한국선진화포럼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고요?

청년 대학생들이 제안하는 선진화의 길

芝巖선진화아카데미
JIAM KFP ACADEMY

차 례

선진화 과제 1: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 (제84차 월례토론회)…42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43

① 공현덕(삼육대학교 경영학과)

② 김민균(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③ 김수현(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④ 김희정(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⑤ 남아영(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⑥ 배하연(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⑦ 서연우(고려대학교 국제학과)

⑧ 송경남(명지대학교 경영학과)

⑨ 이성문(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

⑩ 이승창(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⑪ 정원석(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⑫ 주연아(한양대학교 경영학과)

⑬ 김예진(배재대학교 바이오·의생명공학과)

⑭ 김유라(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⑮ 김현경(군산대학교 해양학과)

⑯ 심성보(공주대학교 공업화학전공학과)

⑰ 장윤석(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⑱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⑲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⑳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98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성균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배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⑬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⑭ 군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⑮ 공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⑯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2: 경제민주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제65차 월례토론회)…161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162

① 권혁규(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② 김승현(연세대학교 사회학과)

③ 김신우(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④ 라광수(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⑤ 유나연(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⑥ 이윤하(경북대학교 경상통상학부)

⑦ 정다래(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⑧ 정민희(한양대학교 행정학과)

⑨ 정예연(청주대학교 경영학과)

⑩ 채　련(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⑪ 최아셀(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193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한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전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청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3: 故 芝巖 선생의 비전과 유산
-대한민국 선공신화의 세대 간 공유(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204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205

① 강유정(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② 공수진(광운대학교 행정학과)

③ 권새암(서울대학교 경제학과)

④ 권혁찬(건국대학교 경제학과)

⑤ 김다솜(건양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⑥ 김덕규(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⑦ 나종문(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⑧ 박상희(한성대학교 무역학과)

⑨ 송지나(동아대학교 경영학과)

⑩ 용지수(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⑪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⑫ 조준상(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⑬ 최민경(고려대학교 정경학부)

⑭ 최현수(홍익대학교 예술학과)

⑮ 김수빈(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⑯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⑰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부)

⑱ 정우재(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251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건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한성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용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4: 공동체의식(나눔, 배려 등)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제83차 월례토론회)…293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294

① 공현덕(삼육대학교 경영학과)

② 김민균(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③ 김수현(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④ 김희정(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⑤ 남아영(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⑥ 배하연(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⑦ 서연우(고려대학교 국제학과)

⑧ 송경남(명지대학교 경영학과)

⑨ 이성문(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

⑩ 이승창(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⑪ 정원석(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⑫ 주연아(한양대학교 경영학과)

⑬ 김예진(배재대학교 바이오·의생명공학과)

⑭ 김유라(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⑮ 김현경(군산대학교 해양학과)

⑯ 심성보(공주대학교 공업화학전공학과)

⑰ 장윤석(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⑱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⑲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⑳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351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성균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배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⑬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⑭ 군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⑮ 공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⑯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5: 국회의 입법과잉, 어떻게 할 것인가? (제80차 월례토론회)…426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427

① 강명재(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② 김영재(삼육대학교 경영학과)

③ 김우갑(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④ 김재혁(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⑤ 김재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과)

⑥ 김혜인(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⑦ 백주아(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⑧ 손계준(서울대학교 지리학과)

⑨ 송현지(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⑩ 이동석(연세대학교 경영학과)

⑪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⑫ 이효정(서울대학교 불어교육학과)

⑬ 임성현(경희대학교 경영학과)

⑭ 김광래(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⑮ 김민정(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⑯ 김수창(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⑰ 김한결(강원대학교 일본학과)

⑱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⑲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⑳ 채 련(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480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인천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상명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⑬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⑭ 부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⑮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⑯ 울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6: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 (제69차 월례토론회)…561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562

① 강소라(서울여자대학교 콘텐츠디자인학과)

② 김재원(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③ 김정원(경북대학교 경영학부)

④ 김화랑(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⑤ 나민아(전남대학교 경영학부)

⑥ 민숙희(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영문학부)

⑦ 유선미(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⑧ 윤보라(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⑨ 장민영(고려대학교 북한학과)

⑩ 정해경(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586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청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경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7: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94차 월례토론회)…655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656

① 김다혜(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② 김수빈(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③ 김승찬(동아대학교 경영학과)

④ 김지용(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⑤ 김한준(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⑥ 박소정(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⑦ 박재형(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⑧ 박현진(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⑨ 백송희(단국대학교 무역학과)

⑩ 송민상(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⑪ 송소담(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⑫ 윤수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⑬ 이윤진(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⑭ 이정진(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⑮ 정우재(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⑯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부)

⑰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⑱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⑲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과)

⑳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709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8: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68차 월례토론회)…763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764

① 강소라(서울여자대학교 콘텐츠디자인학과)

② 김재원(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③ 김정원(경북대학교 경영학부)

④ 김화랑(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⑤ 나민아(전남대학교 경영학부)

⑥ 송민영(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⑦ 윤보라(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⑧ 이철우(청주대학교 무역학과)

⑨ 장민영(고려대학교 북한학과)

⑩ 정해경(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794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청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경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9: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II)…861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862

① 공수진(광운대학교 행정학과)

② 권새암(서울대학교 경제학과)

③ 권혁찬(건국대학교 경제학과)

④ 김다솜(건양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⑤ 김덕규(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⑥ 나종문(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⑦ 박상희(한성대학교 무역학과)

⑧ 송지나(동아대학교 경영학과)

⑨ 용지수(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⑩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⑪ 조준상(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⑫ 최민경(고려대학교 정경학부)

⑬ 최현수(홍익대학교 예술학과)

⑭ 김수빈(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⑮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⑯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부)

⑰ 정우재(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908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건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한성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용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⑬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10: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제99차 월례토론회)…949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950

① 김다혜(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② 김덕규(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③ 류호영(경희대학교 경영학과)

④ 윤수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④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⑤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선진화 과제 11: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란 무엇인가 (제64차 월례토론회)…967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968

① 권혁규(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② 김승현(연세대학교 사회학과)

③ 박민진(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④ 박정욱(세종대학교 교육학과)

⑤ 여정민(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⑥ 이세학(한남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⑦ 이윤하(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⑧ 이정하(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⑨ 이태용(서강대학교 사회학과)

⑩ 정다래(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993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한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12: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제103차 월례토론회)…998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999

① 권순형(서울대학교 경제학과)

② 김주헌(영남대학교 국사학과)

③ 김한슬(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④ 김효원(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⑤ 손재정(고려대학교 중국학부)

⑥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⑦ 이승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⑧ 이재환(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⑨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⑩ 정승훈(단국대학교 철학과)

⑪ 조형원(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⑫ 주아람(건국대학교 경제학과)

⑬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1039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영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경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13: 문화유산의 세계화 (제93차 월례토론회)…1081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1082

① 김다혜(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② 김수빈(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③ 김승찬(동아대학교 경영학과)

④ 김지용(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⑤ 김한준(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⑥ 박소정(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⑦ 박재형(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⑧ 박현진(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⑨ 백송희(단국대학교 무역학과)

⑩ 송민상(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⑪ 송소담(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⑫ 윤수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⑬ 이윤진(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⑭ 이정진(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⑮ 정우재(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⑯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부)

⑰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⑱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⑲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과)

⑳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1137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14: 문화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제81차 월례토론회)…1192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1193

①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②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③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선진화 과제 15: 법률문화의 선진화 (제97차 월례토론회)…1200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1201

① 강유정(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② 공수진(광운대학교 행정학과)

③ 권새암(서울대학교 경제학과)

④ 권혁찬(건국대학교 경제학과)

⑤ 김다솜(건양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⑥ 김덕규(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⑦ 나종문(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⑧ 박상희(한성대학교 무역학과)

⑨ 송지나(동아대학교 경영학과)

⑩ 용지수(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⑪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⑫ 조준상(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⑬ 최민경(고려대학교 정경학부)

⑭ 최현수(홍익대학교 예술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1240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건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한성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용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⑬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16: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I) - 정치, 사회 편 - (제88차 월례토론회)…1283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1284

① 김초아(숭실대학교 행정학과)

② 김태준(한양대학교 정책학과)

③ 김현성(이화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과)

④ 류호영(경희대학교 경영학과)

⑤ 박성찬(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⑥ 손민지(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⑦ 송동근(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⑧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과)

⑨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⑩ 이희진(선린대학교 간호학과)

⑪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⑫ 정복윤(고려대학교 정경학과)

⑬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1320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동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포항지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17: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II) - 경제, 복지 편 - (제90차 월례토론회)…1380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1381

① 김초아(숭실대학교 행정학과)

② 김태준(한양대학교 정책학과)

③ 김현성(이화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과)

④ 류호영(경희대학교 경영학과)

⑤ 박성찬(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⑥ 손민지(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⑦ 송동근(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⑧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과)

⑨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⑩ 이희진(선린대학교 간호학과)

⑪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⑫ 정복윤(고려대학교 정경학과)

⑬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1412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동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포항지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18: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학생과의 대화 (제70차 월례토론회)…1458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1459

① 강소라(서울여자대학교 콘텐츠디자인학과)

② 김재원(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③ 김정원(경북대학교 경영학부)

④ 김화랑(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⑤ 민숙희(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영문학부)

⑥ 송민영(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⑦ 유선미(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⑧ 윤보라(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⑨ 이철우(청주대학교 무역학과)

⑩ 장민영(고려대학교 북한학과)

⑪ 황재인(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1484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경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19: 생활문화의 선진화 (제95차 월례토론회)…1511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1512

① 김다혜(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② 김수빈(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③ 김승찬(동아대학교 경영학과)

④ 김지용(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⑤ 김한준(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⑥ 박소정(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⑦ 박재형(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⑧ 박현진(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⑨ 백송희(단국대학교 무역학과)

⑩ 송민상(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⑪ 송소담(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⑫ 윤수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⑬ 이윤진(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⑭ 이정진(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⑮ 정우재(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⑯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부)

⑰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⑱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⑲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과)

⑳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1565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20: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 (제79차 월례토론회)…1613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1614

① 강명재(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② 김영재(삼육대학교 경영학과)

③ 김우갑(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④ 김재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과)

⑤ 김혜인(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⑥ 백주아(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⑦ 손계준(서울대학교 지리학과)

⑧ 송현지(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⑨ 이동석(연세대학교 경영학과)

⑩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⑪ 이효정(서울대학교 불어교육학과)

⑫ 임성현(경희대학교 경영학과)

⑬ 김광래(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⑭ 김민정(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⑮ 김수창(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⑯ 김한결(강원대학교 일본학과)

⑰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⑱ 채 련(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⑲ 홍용남(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1654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인천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상명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⑬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⑭ 부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⑮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⑯ 울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21: 선진안전의식,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제75차 월례토론회)…1743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1744

① 김민희(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② 김상훈(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③ 김소은(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④ 김유나(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⑤ 김한얼(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⑥ 문지선(펜실베이나주립대학교 경영학과)

⑦ 백유민(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⑧ 송경림(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⑨ 신동일(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과)

⑩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⑪ 홍용남(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⑫ 문용찬(동국대학교 사학과)

⑬ 이윤정(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⑭ 전아영(고려대학교 북한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1779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22: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제85차 월례토론회)…1789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1790

① 공현덕(삼육대학교 경영학과)

② 김민균(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③ 김수현(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④ 김희정(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⑤ 남아영(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⑥ 배하연(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⑦ 서연우(고려대학교 국제학과)

⑧ 송경남(명지대학교 경영학과)

⑨ 이성문(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

⑩ 이승창(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⑪ 정원석(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⑫ 주연아(한양대학교 경영학과)

⑬ 김예진(배재대학교 바이오·의생명공학과)

⑭ 김유라(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⑮ 김현경(군산대학교 해양학과)

⑯ 심성보(공주대학교 공업화학전공학과)

⑰ 장윤석(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⑱ 손계준(서울대학교 지리학과)

⑲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⑳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㉑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1844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성균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배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군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⑬ 공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⑭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23: 시민의식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제73차 월례토론회)…1895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1896

① 김민희(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② 김상훈(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③ 김소은(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④ 김유나(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⑤ 김한얼(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⑥ 백유민(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⑦ 송경림(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1906

①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총신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아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24: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사회에도 존재하는가 (제67차 월례토론회)…1929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1930

① 강소라(서울여자대학교 콘텐츠디자인학과)

② 김재원(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③ 김정원(경북대학교 경영학부)

④ 김화랑(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⑤ 나민아(전남대학교 경영학부)

⑥ 민숙희(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영문학부)

⑦ 송민영(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⑧ 유선미(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⑨ 윤보라(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⑩ 이철우(청주대학교 무역학과)

⑪ 장민영(고려대학교 북한학과)

⑫ 정해경(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⑬ 황재인(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⑭ 채 련(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1970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청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경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25: 외국인이 바라본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제82차 월례토론회)…2052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2053

① 공현덕(삼육대학교 경영학과)

② 김민균(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③ 김수현(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④ 김희정(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⑤ 남아영(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⑥ 배하연(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⑦ 서연우(고려대학교 국제학과)

⑧ 송경남(명지대학교 경영학과)

⑨ 이성문(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

⑩ 이승창(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⑪ 정원석(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⑫ 주연아(한양대학교 경영학과)

⑬ 김예진(배재대학교 바이오·의생명공학과)

⑭ 김유라(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⑮ 김현경(군산대학교 해양학과)

⑯ 심성보(공주대학교 공업화학전공학과)

⑰ 장윤석(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⑱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⑲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⑳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2104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성균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배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⑬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⑭ 군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⑮ 공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⑯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26: 20대 국회에 바란다 (제102차 월례토론회)…2181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2182

① 권순형(서울대학교 경제학과)

② 김주영(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③ 김주헌(영남대학교 국사학과)

④ 김한슬(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⑤ 김효원(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⑥ 손재정(고려대학교 중국학부)

⑦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⑧ 이승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⑨ 이재환(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⑩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⑪ 정승훈(단국대학교 철학과)

⑫ 조형원(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⑬ 주아람(건국대학교 경제학과)

⑭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2223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영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경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27: 인성교육,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제77차 월례토론회)…2262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2263

① 강명재(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② 김영재(삼육대학교 경영학과)

③ 김우갑(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④ 김재혁(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⑤ 김재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과)

⑥ 김혜인(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⑦ 백주아(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⑧ 손계준(서울대학교 지리학과)

⑨ 송현지(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⑩ 이동석(연세대학교 경영학과)

⑪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⑫ 이효정(서울대학교 불어교육학과)

⑬ 임성현(경희대학교 경영학과)

⑭ 김광래(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⑮ 김민정(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⑯ 김수창(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⑰ 김한결(강원대학교 일본학과)

⑱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⑲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⑳ 홍용남(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2308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인천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상명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⑬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⑭ 부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⑮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⑯ 울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28: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제101차 월례토론회)…2416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2417

① 권순형(서울대학교 경제학과)

② 김주영(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③ 김주헌(영남대학교 국사학과)

④ 김한슬(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⑤ 김효원(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⑥ 손재정(고려대학교 중국학부)

⑦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⑧ 이승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⑨ 이재환(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⑩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⑪ 정승훈(단국대학교 철학과)

⑫ 조형원(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⑬ 주아람(건국대학교 경제학과)

⑭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⑮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2461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영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경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29: 중국과의 FTA :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62차 월례토론회)…2505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2506

① 김승현(연세대학교 사회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2507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전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청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30: 증세없는 복지의 과제: 복지의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 (제78차 월례토론회)…2520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2521

① 강명재(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② 김영재(삼육대학교 경영학과)

③ 김우갑(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④ 김재혁(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⑤ 김재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과)

⑥ 김혜인(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⑦ 백주아(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⑧ 손계준(서울대학교 지리학과)

⑨ 송현지(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⑩ 이동석(연세대학교 경영학과)

⑪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⑫ 이효정(서울대학교 불어교육학과)

⑬ 임성현(경희대학교 경영학과)

⑭ 김광래(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⑮ 김민정(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⑯ 김수창(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⑰ 김한결(강원대학교 일본학과)

⑱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⑲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⑳ 채 련(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㉑ 홍용남(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2569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인천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상명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⑬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⑭ 부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⑮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⑯ 울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31: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제87차 월례토론회)…2666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2667

① 김초아(숭실대학교 행정학과)

② 김태준(한양대학교 정책학과)

③ 김현성(이화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과)

④ 류호영(경희대학교 경영학과)

⑤ 박성찬(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⑥ 손민지(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⑦ 송동근(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⑧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과)

⑨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⑩ 이희진(선린대학교 간호학과)

⑪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⑫ 정복윤(고려대학교 정경학과)

⑬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2701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동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포항지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32: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 (제89차 월례토론회)…2757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2758

① 김초아(숭실대학교 행정학과)

② 김태준(한양대학교 정책학과)

③ 김현성(이화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과)

④ 류호영(경희대학교 경영학과)

⑤ 박성찬(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⑥ 송동근(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⑦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과)

⑧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⑨ 이희진(선린대학교 간호학과)

⑩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⑪ 정복윤(고려대학교 정경학과)

⑫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2788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동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포항지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33: 창조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74차 월례토론회)…2837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2838

① 김민희(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② 김상훈(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③ 김소은(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④ 김유나(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⑤ 김한얼(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⑥ 백유민(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⑦ 송경림(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⑧ 이윤정(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⑨ 전아영(고려대학교 북한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2853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아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34: 창조경제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 (제92차 월례토론회)…2880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2881

① 김다혜(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② 김수빈(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③ 김승찬(동아대학교 경영학과)

④ 김지용(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⑤ 김한준(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⑥ 박소정(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⑦ 박재형(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⑧ 박현진(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⑨ 백송희(단국대학교 무역학과)

⑩ 송민상(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⑪ 송소담(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⑫ 윤수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⑬ 이윤진(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⑭ 이정진(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⑮ 정우재(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⑯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부)

⑰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⑱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⑲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과)

⑳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2933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35: 통일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제91차 월례토론회)…2987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2988

① 류호영(경희대학교 경영학과)

②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과)

③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④ 정복윤(고려대학교 정경학과)

선진화 과제 36: 한국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과 진단 (제63차 월례토론회)…3001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002

① 권혁규(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② 유나연(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③ 이정하(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④ 조재진(한국외국어대학교 루마니아어학과)

⑤ 채 련(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3013

① 한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전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청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37: 한중일 새로운 지도자 체제에서의 동북아 정세

: 박근혜 정부의 대외/대북 전략 (제72차 월례토론회)…3026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027

① 김민희(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② 김한얼(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③ 백유민(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3031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총신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38: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 (제98차 월례토론회)…3060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061

① 강유정(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② 공수진(광운대학교 행정학과)

③ 권새암(서울대학교 경제학과)

④ 권혁찬(건국대학교 경제학과)

⑤ 김다솜(건양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⑥ 김덕규(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⑦ 나종문(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⑧ 박상희(한성대학교 무역학과)

⑨ 송지나(동아대학교 경영학과)

⑩ 용지수(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⑪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⑫ 조준상(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⑬ 최민경(고려대학교 정경학부)

⑭ 최현수(홍익대학교 예술학과)

⑮ 김다혜(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⑯ 김수빈(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⑰ 류호영(경희대학교 경영학과)

⑱ 윤수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⑲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⑳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부)

㉑ 정우재(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3121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건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한성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⑪ 용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⑫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⑬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39: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 (제100차 월례토론회)…3167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168

① 권순형(서울대학교 경제학과)

② 김주영(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③ 김주헌(영남대학교 국사학과)

④ 김한슬(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⑤ 김효원(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⑥ 손재정(고려대학교 중국학부)

⑦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⑧ 이승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⑨ 이재환(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⑩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⑪ 정승훈(단국대학교 철학과)

⑫ 조형원(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⑬ 주아람(건국대학교 경제학과)

⑭ 김덕규(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

⑮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⑯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3214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영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경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⑧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⑨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⑩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40: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제105차 월례토론회)…3269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270

①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② 윤다영(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부)

③ 김지영(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④ 김지예(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⑤ 김현경(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⑥ 김효정(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⑦ 유선호(서강대학교 경영학과)

⑧ 이권식(한양대학교 경제학과)

⑨ 이효은(건양대학교 글로벌마케팅학과)

⑩ 장정욱(경기대학교 경영학과)

⑪ 전도훈(원광대학교 한약학과)

⑫ 정영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⑬ 최상연(한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⑭ 하성수(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3310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한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41: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제106차 월례토론회)…3328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329

①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② 윤다영(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부)

③ 김지영(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④ 김지예(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⑤ 김현경(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⑥ 김효정(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⑦ 유선호(서강대학교 경영학과)

⑧ 이권식(한양대학교 경제학과)

⑨ 이효은(건양대학교 글로벌마케팅학과)

⑩ 장정욱(경기대학교 경영학과)

⑪ 전도훈(원광대학교 한약학과)

⑫ 정영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⑬ 최상연(한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⑭ 하성수(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3372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한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⑦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42: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제107차 월례토론회)…3397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398

①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② 윤다영(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부)

③ 김지영(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④ 김지예(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⑤ 김현경(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⑥ 김효정(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⑦ 유선호(서강대학교 경영학과)

⑧ 이권식(한양대학교 경제학과)

⑨ 이효은(건양대학교 글로벌마케팅학과)

⑩ 장정욱(경기대학교 경영학과)

⑪ 전도훈(원광대학교 한약학과)

⑫ 정영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⑬ 최상연(한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⑭ 하성수(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3432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경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한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43: 2017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 (제108차 월례토론회)…3451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452

①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② 윤다영(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부)

③ 김지영(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④ 김지예(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⑤ 김현경(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⑥ 김효정(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⑦ 유선호(서강대학교 경영학과)

⑧ 이권식(한양대학교 경제학과)

⑨ 이효은(건양대학교 글로벌마케팅학과)

⑩ 장정욱(경기대학교 경영학과)

⑪ 전도훈(원광대학교 한약학과)

⑫ 정영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⑬ 최상연(한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⑭ 하성수(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⑮ 김한슬(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⑯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3496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③ 한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④ 경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⑤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44: 산업주의 4.0과 한국의 미래 (제109차 월례토론회)…3510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511

① 김한슬(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선진화 과제 45: 한국적 포용성장의 구상과 전략 (제110차 월례토론회)…3513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514

① 서승경(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② 박현진(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③ 서영우(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④ 송우정(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⑤ 윤예지(충남대학교 경영학과)

⑥ 정지영(명지대학교 행정학과)

⑦ 김주헌(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⑧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선진화 과제 46: 흔들리는 한국자본주의: 새로운 국민정신을 찾아서 (제111차 월례토론회)…3534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535

① 서승경(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② 박현진(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③ 서영우(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④ 송우정(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⑤ 윤예지(충남대학교 경영학과)

⑥ 정지영(명지대학교 행정학과)

⑦ 김주헌(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⑧ 정영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⑨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선진화 과제 47: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 (제112차 월례토론회)…3556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557

① 서승경(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② 박현진(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③ 서영우(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④ 송우정(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⑤ 윤예지(충남대학교 경영학과)

⑥ 정지영(명지대학교 행정학과)

⑦ 김주헌(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⑧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⑨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3580

①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48: 문명사적으로 본 위기관리와 지혜의 리더십 (제113차 월례토론회)…3588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589

①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선진화 과제 49: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 (제114차 월례토론회)…3592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593

① 임해린(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② 김나연(연세대학교 경영학과)

③ 박성준(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④ 이서현(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⑤ 장영임(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⑥ 장준우(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⑦ 정수연(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⑧ 최재원(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⑨ 권순형(서울대학교 경제학부)

⑩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선진화 과제 50: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 (제115차 월례토론회)…3621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622

① 임해린(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② 김나연(연세대학교 경영학과)

③ 박성준(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④ 이서현(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⑤ 장영임(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⑥ 장준우(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⑦ 정수연(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⑧ 최재원(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⑨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3638

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51: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 (제116차 월례토론회)…3640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641

① 임해린(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② 김나연(연세대학교 경영학과)

③ 박성준(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④ 이서현(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⑤ 장영임(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⑥ 장준우(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⑦ 정수연(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⑧ 최재원(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⑨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3656

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②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과제 52: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종교를 통한 포용적 공동체 운동 실천방안 (제117차 월례토론회)…3660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3661

① 권순형(서울대학교 경제학부)

②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선진화 과제 1: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

(제84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공현덕(삼육대학교 경영학과)



한국선진화포럼 제 84차 월례토론회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정치권에서 당장 눈앞의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종종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공약이 남발되는 선거가 유독 잦은 데다 극심한 정치 갈등, 의원입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치 풍토에서 기인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이 2014 년 4 월 24 일 개최한 제 84 차 월례토론회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제조업 경기실사지수에서 알 수 있다'며, '설비투자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는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옥남 바른시민사회 정치실장은 '정부가 법을 만들려면 9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3 단계만 거치면 된다'며 '이런 간단한 절차를 활용해 다양한 규제 입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옥남 실장은 '국회의원의 전문성 문제와 함께 일정 건수 이상으로 규제가 늘지 않도록 만드는 규제 총량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수의 법안들이 포퓰리즘에 영합하여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과도한 의원 입법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전문성의 결여'와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제도를 들 수 있는데요, 입법 과정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형 마트의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은 골목 상권으로 발을 돌려서 골목 상권의 상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의무 휴업 제도 시행 전과 후의 골목 상권의 매출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애꿎은 대형 마트 종사자들만 일을 못 하게 되고, 그 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재래시장 살리기. 방법대 끝뜻되었다.

둘째로 의원들의 이익관계 문제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자신과 연관된 지역 단체나 지역 인사들을 위한 입법을 하고, 그러한 이익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에 벗어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에는 반하는 입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선서가 무색해집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한다기 보다 '정당'에서 정한 당론에 따라 의원발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하향식'의 의사결정체계는 소신정치를 힘들게 하고 의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입법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의원입법의 사전 규제 영향 평가 제도의 제도화'를 발의하였는데요, 과잉 입법을 견제하여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극대화 시키고, 품질 높은 규제 대안들이 도입되어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며, 특정 이해관계의 생성을 차단하여 지대추구행위의 팽배 및 영속화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선출하고,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어느 정당에 속했는지를 따지는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상황에서 그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유권자들도 분석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들은 21 세기 대한민국 선진화의 주역으로서 앞장 서는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참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을까?'등의 주제를 가진 연구모임(토론)을 주기적으로 가지는 등, 대학생들끼리의 의견 교류의 장을 주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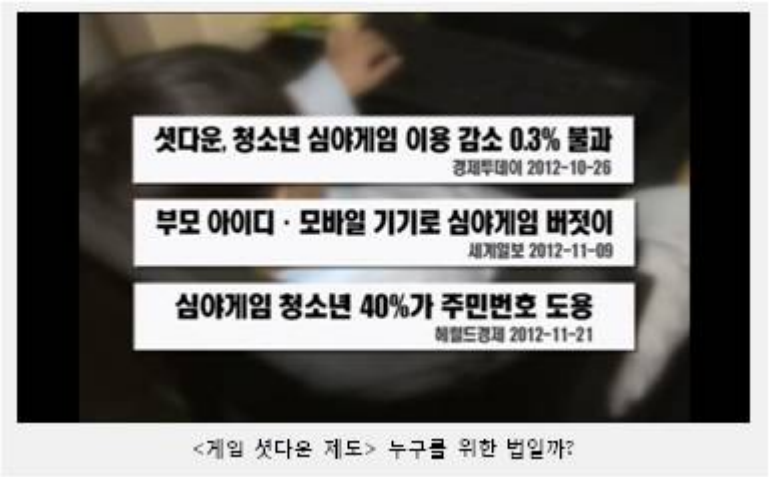
이 모임을 통해 대학생들은 여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게 될 수 있고, 그 토론의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확립하게 됨으로써 21 세기 대한민국 선진화의 주역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입법의 질,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우리 대학생들부터 객관적 시선을 가진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궁극적으로 '양보다 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질 높은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② 김민균(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게임 셧다운 제도> 누구를 위한 법일까?

최근 게임 셧다운 제도가 통과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리판단에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 생각하셨나요? 표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정말 청소년들이 게임을 딱! 끝마칠까요? 저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과거를 비추어 보아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법안 즉,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한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학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한 표면적인 장치에 불과한 포퓰리즘적 입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이처럼 정치인들의 법안 제시 및 공약이 국가 경제에 대한 진정한 고려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4 월 24 일, (재)한국선진화 포럼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정호 프리덤 팩토리 대표는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같은 규제가 '경제를 죽이는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로 인해 발전 없는 그 상태 그대로의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옥남 바른시민사회 정치실장은 "정부가 법을 만들려면 9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3 단계만 거치면 된다"며 "이런 간단한 절차를 활용해 다양한 규제 입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단한 법안 제안 과정이 규제입법 범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살리지 못하면서 대형마트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만 입히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치가 포퓰리즘적 입법과 정쟁에 빠져 경제를 어려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정치혁신을 위해 분산돼 있는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포퓰리즘적 입법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과다한 입법의 현실을 보면, 정부발의 대비 의원발의 법안의 비율이 한국이 7.22 배로 일본의 0.86 배 독일의 0.80 배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분석자료는 이미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현상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포퓰리즘적 입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나, 드러내지 않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의 포퓰리즘적 입법을 지양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 국민은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국민들을 의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적인 양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국민감시제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포퓰리즘적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다음 선거의 고려 사항에서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스스로 의정 감시단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명확히 평가 할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만 하며, 이러한 의식수준이 존재할 때 경제를 살리는 정치 실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합헌의 결정이 내려진 게임 셧다운 제도. 과연 〈게임 셧다운 제도〉 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법률이었을까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의 남발하는 포퓰리즘적 현상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IT 산업의 SNS 시장 선두주자였던 싸이월드는 실제로 페이스북, 트위터보다 훨씬 시대를 앞섰던 네트워크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라는 발목에 잡혀 해외 진출의 기회를 잃었다고 볼 수 있지요.



게임 컨텐츠 사업에 발목을 잡았던 법안?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K-POP 열풍에 대비하여 보아도 게임산업의 가치가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남발하는 규제들로 인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질서의 유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요. 이로 인해 우리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게임산업군에서 세계를 호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우리들을 위한 정치일까요? 과연 그 실효성은 무엇일까요? 의원발의 법안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 선거철마다 남발하는 포퓰리즘적 입법인 규제들. 이러한 모든 선심성 공약은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더 나아가 경제를 죽이는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독 때문에 게임을 막는 것이 아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Esse, Non Videri”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유럽 스웨덴에서 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단 하나의 발렌베리 일가 가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지만, 세계 1,000 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지요.

발렌베리 가문은 특권 대신 책임을 선택하며, 스웨덴의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웨덴에서 발렌베리는 자본주의, 힘 그리고 봉사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라는 일을 할 때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포퓰리즘적 입법인 규제가 아니라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 진정으로 필요하며 정말로 꼭 해야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정치가가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정치가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진출처 :
사진 1,3 - http://youtu.be/l68xeCmpJw4
사진 2 - http://youtu.be/Fs1fUya-Rqg

③ 김수현(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지난 4월 24일 개최된 월례 토론회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

다가오는 6 월 4 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불거지는 사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특히 이러한 포퓰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경제 분야인데요. 올 초부터 이어진 '경제민주화'와 '순환출자 금지 입법' 그리고 과거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가 경제와 관련된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 월 24 일, (재)한국 선진화 포럼에서 주최한 제 84 차 월례토론회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 한국사회가 지닌 포퓰리즘과 경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해결책에 대해 토론하고 지적 교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김기천 논설위원은 최근 SNS 의 확산으로 인해 포퓰리즘을 넘어선 포퓰러리즘(Popularism)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시며 정치인이 대중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함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교수는 정치와 경제 사이의 관계와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의 양심과 진정한 정치인들의 필요성 그리고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평가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창원 교수와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은 대표적인 표퓰리즘적 정책인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인 규제가 한국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임을 이야기하시며, 규제심사절차와 같은 규제입법에 대한 국회내부의 통제장치의 필요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회가 포퓰리즘의 문제를 겪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원인을 '국회의원의 전문성의 부족'과 '의원입법 규제심사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발의 입법절차에서 규제심사의 부재는 우리 사회가 포퓰리즘의 늪에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 경제, 사회적인 정당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안발의 수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을 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원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재 또한 큰 문제입니다. 지난 2004 년부터 2013 년 8 월까지 헌법불합치, 위헌으로 결정된 법 조항을 분석한 결과 경제 관련 법안은 총 152 건 이었으며 이 중 36 건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의원입법 규제심사의 부재'로 인하여 법안을 발의하기 전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단순히 법안발의 수의 증가를 위해, 표를 얻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또한 간단한 의원발의 입법절차로 인해 헌법불합치, 위헌인 법안들이 통과되며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인해 사회와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97 년부터 06 년까지 이어졌던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기업의 독식을 막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의 성장을 막고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들의 도태로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소수의 성장을 막고 다수의 성장을 추구하였지만 결과적으론 소수와 다수 모두가 피해를 본 것 입니다.



단순히 표만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이 같은 정책은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현재의 표에 치중하여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얻고 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얻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해결책을 의원입법 과정에서의 사전, 사후심사와 정당성과 필요성에 입각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법안 제출 과정은 의원입법이 정부입법 절차보다 간단합니다. 정부입법 절차는 9 단계를 거치지만 의원발의 입법절차는 3 단계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 중 정부입법 절차는 준비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규제심사를 실시하지만 의원법률안은 별도의 규제심사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당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듯 의원발의 입법절차에서의 사전, 사후 심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원발의 입법절차에 규제심사가 포함된다면 포퓰리즘에 입각한 입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의 입법절차에 규제심사와 같은 과정이 포함되게 된다면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안들을 줄여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법률안에 대한 자체 심의가 매우 엄정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층적인 심의와 분석을 통과한 법안들이 발의되며 가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법안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와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 과정의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국 또한 의원입법 과정을 늘리고 사전, 사후심사를 하게 된다면 현재와 같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고 한국의 경제성장의 밑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로 가득하고 이로 인해 경제 발전 또한 더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발의 과정에서 사전, 사후심사를 통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정책들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표만을 원하는 Follower 가 아닌 한국의 성장과 국민을 이끄는 진정한 Leader 가 된다면, 한국의 정치와 경제는 보다 선진화가 되지 않을까요?

④ 김희정(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지난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84차 월례토론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정치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시장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경제성장률을 보면 1999 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이렇게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함께 나타난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부문에서 경제성장에 힘써야 할 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지난 4 월, (재)한국선진화포럼은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월례토론회에서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은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 저성장을 가져온다고 지적했으며 이옥남 바른시민 사회 정치실장은 국회의원의 간단한 입법절차가 다양한 규제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가 표를 얻기 위해 과도한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포퓰리즘이 경제성장 저해의 요인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번번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더 많은 규제 입법을 가져온다며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함을 언급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국민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과정에서 대중영합적인 정치행동을 통해 오히려 경제를 죽이는 공약을 무분별하게 내세우는 포퓰리즘 문제가 가장 해결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표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 그 여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전인 예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인데요, 골목상권 유권자를 겨냥한 이 규제는 대형마트의 매출액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재래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기대 했던 것과는 다르게 대형마트는 물론 재래시장의 매출액 또한 감소하는 현상을 가지고 왔으며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습니다.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형마트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의 손해를 재래시장의 이익으로 돌리려 했기 때문이지요.

이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도 어긋나는 규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고 있는 포퓰리즘적 경제 규제정책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새로운 입법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더욱 신중하게 법안을 입안하고 그 법안이 실제 시행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7 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5728 건. 이는 18 대 국회에서 1 만 1191 건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중 그 실효성을 발휘하는 법안의 수는 발의된 수에 비해 극히 적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데서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에 대한 책임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또한 선거가 진행될 때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일차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됩니다. 지난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내세운 공약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눈앞의 이익에 가려 보이지 않는 부정적 요소는 무엇이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정치인 모두의 관심에 포퓰리즘적 정치의 해결방안이 있다.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더 이상 그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법안 발의를 제한하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이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는지 끝까지 파헤쳐 공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표를 얻기 위해 경제 민주화법을 과도하게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명단과 그 법안으로 인해 입은 우리나라 경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표는 국민들로 하여금 눈 앞의 이익이 아닌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후보들 또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게 하고 제시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의 태도 또한 변화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없음을,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을 탓하지만 말고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줄 국회의원을 찾고 이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정쟁과 사사로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⑤ 남아영(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4월 24일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 84차 월례토론회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가 정치권에서 표심을 잡고자 내거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경제를 죽이는 정치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기 때문이지요.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제 84 차 월례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은 이와 같은 한국의 정치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은 규제가 경제를 죽이는 정치의 예이며 포퓰리즘식 입법을 남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원, 유권자 모두가 이를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더불어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이야기하며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옥남 바른시민사회 정치실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이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고 하였고 김기천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포퓰리즘에 좌우된 외국 사례를 지적하며 진정한 리더가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네 분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도 유권자인 국민의 자각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도덕감정 함양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유권자가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소신을 바탕으로 의결권을 지닌 정치인을 뽑는다면 이처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정치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개 포퓰리즘식 의원입법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정치인들이 당장 눈앞에 급급한 유권자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해서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권을 획득하고 재선을 목적으로 대의보다는 사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그 근본을 낳는 표심을 올곧게 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도덕감정 함양이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만든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도덕감정 함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이야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올바른 정치 교육을 통한 유권자 의식 개선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국가적인 정치 교육의 확대와 생활 속에서 도덕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정치 경험,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적인 정치 교육의 확대는 기본적인 도덕감정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권자인 국민들이 먼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정치를 이루어나가는 데 필수적이지요. 물론 충분한 정치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치 교육에 있어 상당히 낙후된 모습을 보입니다. 정치와 관련된 교육은 '일반사회' 교과에서 주로 다루어지며 '정치' 과목은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의 형태를 띱니다. 더군다나 교사는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정치성향을 드러낼 수 없고요. 다원적인 정치교육과 생활 속에서의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원적인 교육주체를 활용하여 국가적인 정치 교육을 펼치는 독일

이에 반해 선진국 독일의 경우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관·정·민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치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에서 정치교육을 총괄적으로 기획 및 재정지원을 하며 '베를린 주정치교육원(Berliner Landeszentrale)'과 같은 15 개의 주정치교육원, 여러 연구단체, 정당재단, 시민단체, 기업 등이 이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다원적인 교육주체를 활용하여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정치 교육의 기회 제공은 상대적으로 잦은 노출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유권자가 스스로 본인이 유권자임을 자각하게 돕고 보다 많은 정치적 관심을 이어가게 돕는 방안이 되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학령기 선택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과는 확연히 다르지요.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병행되지 않고는 유권자가 스스로 도덕감정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적 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정치교육원을 두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일 주체를 통한 교육보다 다양한 주체들을 통한 교육은 보다 폭넓은 정치적 식견을 불러오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단순히 정치적 관점 형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을 자연스레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그 경험,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시민단체를 기반으로 한 정치 경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네트워크가 존재하지만 이에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는 경우보다는 주로 단편적인, 선거와 같은 참여에만 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의 시민단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감정은 온라인의 경우 왜곡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프라인 활동에 보다 중점을 두어 실질적인 정치 경험을 증진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학령기 학생들에게는 정치 관련 동아리를 형성하게 하고 이외의 시민들에게 역시 각종 의정활동 감시나 평가와 관련된 시민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권자 개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해도 사회 전반이 비도덕적인 것이 자연스럽다면 유권자들은 옳은 선택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또 이를 생활 속에서 살펴볼 기회가 적다면 더욱 스스로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특히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실천을 위한 계몽이 요구됩니다. 정치 교육을 통해 관점을 형성했다면 자연스레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들을 통해 도덕감정을 지켜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덕감정이 유권자에게서 퍼져나간다면 자연스레 정치인들로 확대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로의 전환은 이를 만들어나가는 이들의 자각을 토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은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정치를 할 정치인을 선택하고 정치인은 도덕성을 토대로 전문성을 함양하여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날의 문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처럼 유권자의 정치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경제를 죽이는 정치를 살리는 정치로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내의 과도한 경제 관련 규제나 정치적 갈등으로 말미암은 법안 통과 지연 등이 개선된다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경제 선진국으로, 또한 정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⑥ 배하연(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제 84차 월례토론회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우리 정치사회의 문제점으로 당장 눈 앞의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약이 남발되는 선거와 극심한 정치 갈등, 의원입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치 풍토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4 월 24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라는 주제로 우리 정치사회에 만연해 있는 포퓰리즘 정치 현실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84 차 월례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은 한국 정치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님은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를 근거로 들어 선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해주셨고,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님은 포퓰리즘 입법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님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경제를 죽이는 정치이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옥남 바른시민사회 정치실장님은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분의 안정과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장 눈 앞의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정치사회에서 부분의 안정과 균형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정치사회에서의 안정과 균형은 매우 불안정해 보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이 강화됨에 따라 정치인들은 국민의 인기를 의식하여 더 많은 득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남발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이 증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게다가 유권자들 역시 자신의 요구와 이익에 치중하여 정치인들에게 자신에 유리한 정책만을 요구합니다. 유권자가 현명한 기준과 양심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아부하는 포퓰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정책을 통한 권력 행사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경제 정책은 정당 간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해관계와 정쟁에 치우쳐 오히려 경제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와 설비투자지수를 통해 선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 여년 간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하향곡선을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무분별하게 공약되었던 경제정책이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기업은 투자활동 및 사업계획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민간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어 경기 활성화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또한, 의원 입법의 과도한 의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 의원발의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규제가 남발될 소지가 큽니다. 더구나 의원입법은 행정부가 규제를 만들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규제영향평가 등 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를 살리는 정치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부분의 안정과 균형이 확보되어야 할까요?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구성원 즉, 유권자와 정치인의 도덕감정과 책임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입법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양심 있는 정치참여를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인 역시 장기 비전을 가진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개인에의 의지에만 호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적절한 제도가 동반되어야 하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 독단이 아닌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의회가 제시한 안건을 국민이 검토하고, 국민들 스스로의 만족도를 높여 의회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입니다.

물론, 유권자들 역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분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입법 발의에 관심을 가져야 함이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이를 통해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선출하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치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도덕감정과 분석적 관심에 비하여 정치인들의 책임감과 리더십 역시 필요하겠지요.

국민의 분석적 참여와 정치인들의 책임의 적절한 균형을 활용하는 경우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타운미팅'이 있습니다. 행정위원이 정책 결정과 관련된 안건을 제시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여 토의를 통해 정책을 표결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시민들의 정치 및 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의회와 시민간의 적절한 협력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정치사회 구성원들의 균형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정치에의 직접 참여는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사회에 대한 책임감은 물론 도덕감정과 양심까지 길러줄 수 있고, 막무가내식 입법을 막아 정치인들에 경각심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입법이 국민이나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도구를 말합니다.

유럽 국가는 입법영향평가를 이용하여 사회집단의 다양한 의사를 파악하고 입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유권자들의 신뢰와 더불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역시 '타운미팅'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생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참여에 대한 도덕감정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 실정에 맞는 대상과 과정을 선정하여 시행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규제영향분석, 법안비용추계, 부패영향평가 등의 입법과 관련된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련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수행되어 평가기준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때문에 국민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입법과 관련하여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권자와 정치인의 균형의 좋은 예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이에 대해 프리덤팩토리의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정치사회 구성원의 균형 유지를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국회의원별 입법활동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국민들에게 입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회의 입법과잉을 막고 입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인 셈이지요.

이 서비스는 평가보고서를 국회의원에게 발송하고 언론에 공개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하며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입법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구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와 같은 국민들 자발적으로 만든 소규모의 모임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단체가 영향력을 확보해 가는 가운데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유권자들의 분석적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더불어 정치와 경제 등의 사회 전반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학생들과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입법 발의와 정책 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입법서비스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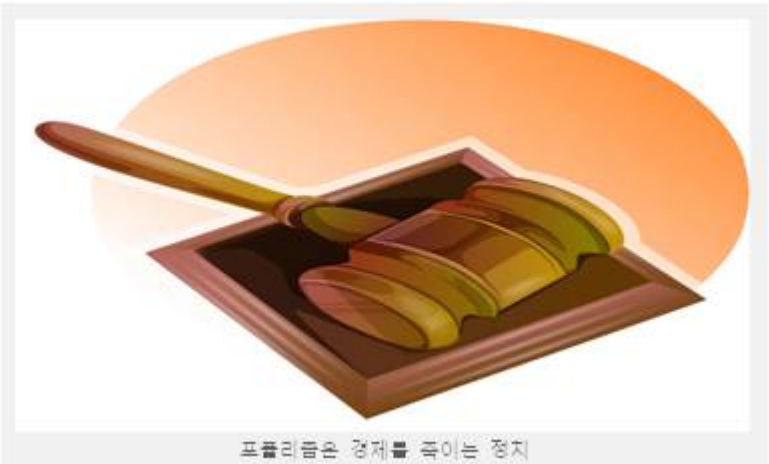
대학생들이 입법 활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를 내림으로써 올바른 정치 지식을 쌓아감은 물론 미래 인재로의 대비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생들의 공감능력과 SNS 를 통한 소통능력은 이를 범국민적인 관심으로 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대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보다 책임감 있고 공정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전체 정치사회를 위한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균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는 정치사회 구성원의 현명함과 책임감이 바탕이 된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와 정치인 개개인의 도덕감정, 책임감과 같은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우리사회의 보다 나은 리더(Leader)와 팔로워(Follower)들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적절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규제영향평가 혹은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등의 장치를 통해 입법과정에서의 투명함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책임감과 양심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한 긍정적 순환고리가 한국의 정치를 '경제를 살리는 정치'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⑦ 서연우(고려대학교 국제학과)



포퓰리즘은 경제를 죽이는 정치

요즘 과도한 입법안들이 많은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법률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과도한 규제들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재)한국선진화포럼은 4 월 24 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이옥남 바른시민사회 정치실장,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가 참가하여 국회의 표퓰리즘적인 입법 활동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김정호 대표는 정치인들 중에 진정한 리더가 나타나야 포퓰리즘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옥남 정치실장은 국회의원들이 일정 건수 이상으로 규제가 늘지 않도록 규제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창원 교수는 정치 부분에서도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사무국 내에 전문적인 규제심사 및 평가를 위한 보조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최종찬 대표는 표퓰리즘적인 입법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치인들의 평가기준의 변경

표퓰리즘의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대책과 사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치인들이 평가 받는 기준의 변경, 입법실명제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우선, 현재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의 개수입니다. 이러한 평가기준 때문에, 정치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법률안을 통과시키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과시킨 법률의 개수를 책정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나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입법활동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실명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는 누가 어떤 법안을 제기했는지 확인이 힘듭니다. 이러한 입법의 익명성이 현재 나타나고 과잉입법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입법을 했는지 공개함으로써, 무분별한 입법을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입법영향평가제도

또한, 현재 행정부보다 많이 간소한 국회의 입법절차를 고쳐야 합니다. 이러한 간소한 절차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잉입법과 포퓰리즘적인 법률안들이 생겨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차적인 단계를 늘리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현재 입법과정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특정 법률이 사회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로서 현재 가장 적합한 것으로는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특정 법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법률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표퓰리즘적인 법률안들을 막을 수 있고, 사전적인 분석을 통하여 법률이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특정 법률안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적인 예방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특정 법률이 미치는 실제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후 입법영향평가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특정 법률이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입법실명제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누가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선거에서 실효성 없는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이며, 우리 나라의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대학생들도 단순히 정치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SNS 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정치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대학생들의 생각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조직을 형성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이 조직화됨에 따라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대학생들 또한 교내와 교외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 의사소통하며, 대학생들의 생각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우리 나라의 정치에 더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이며, 대학생들이 매일 고민하는 청년실업의 문제도 조금 더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법영향평가제도, 사후 입법영향평가제도, 평가기준의 변경, 대학생들의 SNS 감시망은 우리 나라의 정치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정치가 보다 선진화 될 수 있다면, 우리 나라가 바라보고 있는 GDP 4 만불의 시대도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⑧ 송경남(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오늘 날 대한민국은 압축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국가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세계경제의 주요 국가로 발돋움 하였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국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적의 입법정치로 인해 사회의 각 부분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는 지난 4 월 24 일 제 8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 경제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 ‘ 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례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6 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경제를 죽이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국회의 포퓰리즘적인 입법 활동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 중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같은 규제가 ‘경제를 죽이는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면서 “국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살리지 못하면서 대형마트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만 입히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치가 포퓰리즘과 정쟁에 빠져 경제를 어려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재정 적자를 일정 금액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장치인 재정준칙을 이야기하며 "정치 혁신을 위해 분산돼 있는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포퓰리즘 입법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옥남 바른시민사회 정치실장은 "정부가 법을 만들려면 9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3 단계만 거치면 된다"며 "이런 간단한 절차를 활용해 다양한 규제 입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서 일정 건수 이상으로 규제가 늘지 않도록 규제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국회란 무엇인가요? 법은 무엇인가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비판적인 행정 통제를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우리 사회의 규칙을 만드는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국회와 법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포퓰리즘을 두고 민주주의의 숙명이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포퓰리즘은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활동'을 말합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귀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배려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눈치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날 국회의 포퓰리즘적 입법은 후자를 잘 대변하는 사례일 것 입니다. 모두의 입맛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특정집단의 입맛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수많은 포퓰리즘적 입법이 시행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포퓰리즘적 과잉입법을 줄이고, 진정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입법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국회의원의 개개인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사실상 이것은 힘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퓰리즘적 과잉입법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설치 함으로써 올바른 입법을 이끌어야 할 것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와 국회의원들의 공청회 등을 통해 과잉잉법을 조절하려는 장치를 마련해놓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의 과잉입법을 규제하는 '규제영향평가제' 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과잉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의 제도와 장치들이 서로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아닌, 각각의 제도와 장치들이 분산되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고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포퓰리즘 입법

따라서 기존의 국회 입법조사처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영향평가제'와 스웨덴 의회의 '옴부즈만' 제도의 성격을 결합한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북유럽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는 여러 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권의 확대·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권리 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그 명칭의 의미는 "의회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1909 년 스웨덴 의회에 설치되었으며, 옴부즈맨은 군사기밀과 성문제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공개합니다.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의 순기능으로 인해 스웨덴은 국가 부패지수가 3 위에 위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입법을 규제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입법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는 입법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어 모든 입법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옴부즈만' 제도의 중립적인 마인드를 지닐 수 있는 '입법규제관리기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입법규제관리기관'은 규제영향평가제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원들의 입법들을 공정한 시각으로 판단하여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고 조건이 미달되는 입법제안의 수가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그 국회의원에게는 입법제안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옴부즈만' 제도의 어느 한 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중립에 서서 바라보는 공정성을 지닌 판단력과 '규제영향평가제'의 입법규제 시스템을 결합하여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입법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규제를 시행한다면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입법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를 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할 것 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라보는 순간 포퓰리즘은 부정적인 의미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위해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발전된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⑨ 이성문(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



저출산 고령화 현상, 2011 년 이후로 지속되는 4% 이하의 경제 성장률 등 많은 객관적 수치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를 통해 '법'을 세우며, 법을 통해 경제가 때로는 느슨하게 때로는 타이트하게 운영되면서 그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거나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4 월 24 일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에서 개최한 월례토론회에서는 바로 이 점에 기인하여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이창원 교수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꼭 필요한 법안이 지연되거나 정체되는 등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포퓰리즘의 형태로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경제 영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효과를 불러오지 않고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도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금액을 베풀어 많은 표를 얻고자 하는 막무가내식 인기 영합적 정치행위로 인해 경제를 죽이는 정치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즉, 정치인은 '표를 얻기위해', 유권자들은 '이익을 얻기 위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지점에서 포퓰리즘 정치가 등장하고 이것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로는 '입법'에 대한 사전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의원이 입법 과정에는 정부발의법안과는 다르게 규제 심사 절차가 없어 오직 의정활동평가를 올리기 위한 혹은 사적 이해관계의 합치 여부에만 의거하여, 자신의 법이 경제영역에 가져올 영향에 대한 숙고 없이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한다면 법안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포퓰리즘적 정치행위도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권자들의 의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치인들을 우리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고 압력을 가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경제를 보고, 현재 경제영역에서 존재하는 모순점과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식으로 정책을 청원하거나 요구하는 등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즉, 악의 방지를 통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우리사회에는 기업, 자본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에 가까운 시선을 보내면서 대립구도를 세우려는 경향이 만연해 있는데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상생할 수 있는 관점으로의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유권자인 동시에 기존의 프레임에 물들지 않는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정치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은 학내에서 자체적으로 건전한 유권자 의식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의 정책방향을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건전한 의식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20 대 청년들이 생각하는 현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회, 학술모임 등과 같은 건전한 비판의 장을 통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인터넷 청원, SNS 를 통한 의식 공유 등 실제 입법에도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실효성을 얻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대학생들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건전한 시각과 민의를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⑩ 이승창(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한 나라 경제의 흥망성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한 나라의 정책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공산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차이를 통해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지난 4 월 27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각 분야 교수님들과 전문가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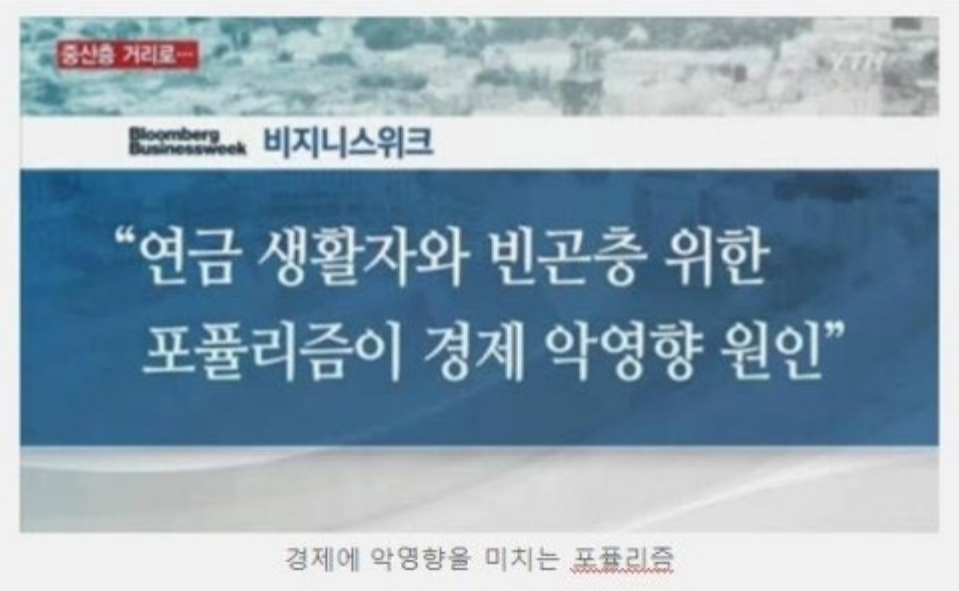
이창원 교수님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예산과 민생 관련 법안, 경기활성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민간기업들은 신년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바른시민사회 이옥남 정치실장은 정부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9 단계가 필요하나 국회의원은 단계로 법안통과 절차가 간단한 국회의원이 다양한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김기천 논설위원은 국민의 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정치에서의 '티 파티운동'과 같은 대중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김정호 교수님은 27 년간 유지되다 결국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예시로 들어 경제를 죽인 대표적 정책을 설명하는 동시에 현재에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주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나 순환출자 금지 입법도 경제를 죽이는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와 같이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 나오는 이유는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내세운 공약의 효과나 실천가능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2 년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정치권 공약대로 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 이라고 언급하면서 성장률이 3%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 성장 기반 확충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정치권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연간 성장률 3%의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우리나라는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을지라도 경제를 죽이는 공약이 아닌 인기가 없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공약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선거공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포퓰리즘에 의존한 선거공약이 대중의 표심을 자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중이 좀 더 객관적으로 공약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치와 완전히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전문가 집단이 의원들의 공약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 가능성과 예산추가 부담 정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인기를 받는 정책이 경쟁을 회피하고 무상복지 등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보호 아래 경쟁을 피하고 실제로는 '공짜'가 아닌 '공짜복지'라는 말에 유혹되는 정책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기는 없더라도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인기에 휩쓸려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것이 아닌, 지금은 경쟁과 새로운 도전 때문에 힘들더라도 후에 더욱 성장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여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대중의 인기를 이용하여 나오는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들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를 통해 기대했던 동네 빵집의 소득보호와 달리 역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제과협회가 집계한 동네빵집 수는 2012 년 4378 개에서 지난해 11 월 4762 개로 소폭 늘어났을 뿐입니다.

반면 신생 프렌차이즈점 이지바이는 규제 직전 지난해 2 월말 57 개 매장수에서 작년 말 123 개로 늘어났으며 오히려 브리오슈 도레나 치즈케이크펙토리와 같은 외국계 기업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프렌차이즈점의 고용인원이 줄고 권리금도 40%이상 올라 창업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학자 이익은 나라를 좀먹는 6 가지 도둑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이 선생이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면 아마도 위와 같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6 가지 도둑에 포함시켰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선진화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를 죽이는 정치를 해결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이미지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KJMbpgErmcw

⑪ 정원석(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제 84차 윌례토론회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

6.4 지방선거가 앞으로 한달 안으로 다가 왔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자신들이 당선되었을 때 이루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공약으로 만들어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약들 중에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정책들도 있지만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공약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 정책의 결과는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여 한쪽의 손해를 바탕으로 다른 한쪽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4 월 24 일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신의 실적만을 위한 무분별한 입법과잉과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기업의 압박으로 인한 규제완화가 힘들어 원활한 시장경제가 움직이지 못하는 점, 포퓰리즘적 규제정책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포퓰리즘 정치였습니다.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님은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얘기하시면서 이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던 골목 상권, 즉 재래시장의 매출액도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이는 포퓰리즘 규제정책의 실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형마트 규제로 인하여 모두 피해를 본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재래시장 상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진행된 대표적인 포퓰리즘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선거 이후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포퓰리즘 규제정책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국민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해서도 혜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시장의 원리를 인지하고 이 원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경제학의 원리를 가지고 정치를 해 나아갔을 경우에 지역구민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의견을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잘 판가름하여 진행할 수 있고 규제완화로 인해서 경쟁을 통한 발전하는 시장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이 보이는 플랜카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를 장려하는 플랜카드입니다. 근무시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투표를 하는 자세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심을 얻기 위하여 공약을 펼치는 후보자는 당선 이후에 공약을 지킬 확률도 높지 않고 공약이 지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공약을 펼치는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포퓰리즘 공약은 점점 줄어들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을 밀어 붙여서 결과로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에게 끌려 다니는 팔로워가 아닌 리더를 선출하고 리더가 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을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야 말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이미지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mQfPXioAdyQ

⑫ 주연아(한양대학교 경영학과)



4월 24일, '경제를 살리는 정치, 경제를 죽이는 정치'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요즘의 정치국면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대리인 문제'라는 단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대리인 문제' 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회사의 경영을 경영 전문가에게 위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쓰이는 말이지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을 모색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직위를 보장받기 위해 오직 '표' 를 더 많이 받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는 데에 혈안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정치인들의 법안 제시 및 공약이 국가경제에 대한 진정한 고려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 월 24 일,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같은 규제가 '경제를 죽이는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옥남 바른시민사회 정치실장은 "정부가 법을 만들려면 9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3 단계만 거치면 된다"며 "이런 간단한 절차를 활용해 다양한 규제 입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단한 법안 제안 과정이 규제입법 범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살리지 못하면서 대형마트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만 입히고 있다" 며 "우리나라 정치가 포퓰리즘과 정쟁에 빠져 경제를 어려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정치 혁신을 위해 분산돼 있는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포퓰리즘 입법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만큼 국가경제를 위해 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정치인들이 제안하는 법안 및 공약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는커녕 도리어 해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즉, 더 많은 표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계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정작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은 없고 '포퓰리즘'만 남게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은 무상복지의 남발과 지나친 규제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때 '무상급식'이 큰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지요.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무상급식을 통해 학생 모두에게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가난한 학생과 비교적 풍족한 학생들 간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무상급식의 부작용으로 일부 학교 학생들은 '무상급식 전보다 급식의 질이 훨씬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차라리 돈을 내고 밥을 먹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지요.


무조건적 '복지'와 '규제'는 국가경제 발전에 위협이 될수 있음

물론 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야 할 방향이지만 국민의 '표'만을 의식한 채 충분한 재정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실행하는 '무상복지'는 국가재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조건 '규제'의 방법만을 고려하는 것도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업종을 명시하고 중소기업만이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실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기업의 특정 업종에 대한 진출을 막는 '규제'는 결국 시장경제의 원활한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결과뿐이었습니다. 보호를 받게 된 중소기업은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고 안이한 자세로 경영한 탓에 세계경제가 개방된 지금, 결국 외국업체의 제품과의 경쟁에서는 밀리는 사례가 나타났을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정치인들의 입법 및 규제로 인한 국가경제에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국회의원의 지나친 규제발의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법안을 제의하였는가?' 처럼 단순히 제안한 입법의 '수' 만을 고려한 정량적인 평가만이 아니라 사후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제안한 법안 중 얼마나 많은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었는가?' 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렇게 통과된 법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또한 평가하는 '다각도' 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활동 실적에 대한 보다 다각도적인 평가가 필요

나아가 법을 제안함에 있어 제안자의 이름을 딴 법을 만드는 것도 법안 제의에 있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터넷 악성댓글을 경계하자는 취지로 고 최진실씨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최진실 법'과 같은 것이지요.

이처럼 발의자의 이름을 딴 법이 생긴다면 발의 전에 심사숙고 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제안자 본인의 이름을 딴 법의 한계나 잘못이 지적 받는다면 제안자 또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대학생인 우리들이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현재 정치인들이 제안하는 법의 내용이 곧 미래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정치인들의 입법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오늘날 대기업들이 바른 경로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이 정치인들의 활동을 대학생이 우리들도 큰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대학생인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취업'임을 감안할 때, 현재 정치인들이 진실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을 제안하는 것이 맞는지를 살피고, 만약 이런 방향이 아닌 특수 집단만의 이익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하겠지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들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역할, 즉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리더는 외로운 자리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치인이 되기를 선택한 이상, 외로움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이따금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외면 받을지라도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법을 제안하는 것이 정치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질이 아닌가 합니다.

⑬ 김예진(배재대학교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우리나라를 흔드는 가장 큰 힘,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이끄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정치'와 '경제'가 가진 힘에 관해서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치와 경제는 한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경제, 이 두 분야는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가 미치는 경제적 득과 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지난 4 월 27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라는 주제로 제 8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경제를 죽이는 정치의 예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들며 국회의원과 같이 국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포퓰리즘식 입법을 남발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골목상권을 살리지 못하고 대형마트 관련 종사자들에게 피해만 입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해 이야기하며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이옥남 바른시민사회 정치실장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수많은 규제 입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규제입법 범람의 원인이며 국회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김기천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의 자각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월례토론회에서 '경제를 죽이는 정치'의 경우를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퓰리즘의 남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포퓰리즘에 동요되지 않는 유권자가 되어야한다는 사실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 모두 포퓰리즘이야말로 경제를 죽이는 정치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쯤 포퓰리즘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를 죽이는 정책, 포퓰리즘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형태인 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가들, 즉 포퓰리스트들이 많을수록 '빛 좋은 개살구'에 가까운 정책들만 쏟아져 결국 경제를 죽이는 사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퓰리즘의 단점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사례가 바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해도 적합하다 여겨지는 업종을 지정하고 지정업종의 사업분야에 대기업의 신규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나, 점차 보호받는 산업들의 낙후로 이어져 제품의 품질은 낮고 가격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WTO 가입 등 국내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자 외국제품들이 밀려들어오게 되면서 지정된 기업들은 시장을 내어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국내기업의 발전을 취지로 했던 정책이었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를 죽이는 정치에 대해 우리는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제를 죽이는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즉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치를 일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원입법의 질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편 가르기 식 규제 입법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의원입법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해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각이 가장 필요합니다. 유권자로서 관심을 보이며 우리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자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면 올바른 유권자이자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정치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진사회를 이끄는 주역은 오늘의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현재 가장 크게 직면하고 있는 그들의 위기인 청년실업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정치적 관심은 반드시 높아져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이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선, 대학생들이 대학생들끼리의 지적교류를 높일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생 단체를 만들어 활동이 활발하고 파급력이 뛰어난 메신저나 SNS 를 통해 관련된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 미래의 주역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법 관련 다양한 홈페이지에 '입법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입법은 당장만이 아닌, 향후 몇 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책임질 주역인 대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법 실명제'와 같은 자각운동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정책이 시현되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경제라는 커다란 게임의 구성원이라면 정책은 게임을 지시하는 규칙과 같습니다.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이 올바르고 명확하게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유권자로서 게임, 즉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시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늘 '대학생'들이 서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이끌어 갈 실질적인 책임자인 대학생들이 먼저 이를 자각하고 실천한다면 포퓰리즘을 퇴치하고 진정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⑭ 김유라(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지난 4월 24일,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에 대한 월례토론회

현재 한국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넘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일상에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암 덩어리'라고 칭하는 존재를 아시나요? 그 '암 덩어리'는 바로 '규제', 즉 잘못된 입법들입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들이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하나, 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 월 24 일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라는 주제로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제 8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먼저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께서는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모순과 최근 규제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님께서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적인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경쟁보다는 인정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치력을 회복시키고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차단하자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에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께서는 두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덧붙여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규제로 인해서 경제가 살고 있지 못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타파하자

다른 나라에는 이미 외국 대학의 유치가 끝났다면, 인천 송도에 예전부터 하기로 했던 우리나라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또한 의료 사업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도 걸림돌입니다. 전에는 '그냥 규제가 많은 정도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현재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법들이 형성된 데에는 포퓰리즘적인 성향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투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법의 입법이 간결하고 쉽습니다.

좀 더 까다롭고 많은 절차를 통해서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바꿔야 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은 오래된 우리나라의 속담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뽑는 것은 지양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생각으로 결정을 한다면 정치인들도 올바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전제에는 바람직한 정치인을 뽑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바라는 혹은 현실성 없는 단기적인 법안을 내놓는 사람을 뽑지 말아야 합니다.

의식을 바꾸는 방법에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학교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의 비영리 단체 설립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진지하게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성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적당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양로원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은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하였고, 다른 집단은 수동적으로 해주는 것을 받기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율적으로 통제력을 가지고 있던 집단은 더 건강해졌으며 통제력을 상실한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건강 악화, 정서 불안 등 결국 생을 더 빨리 마감하였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자율성과 같은 통제력을 가지는 것이 해결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조언을 듣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자신만의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만이 법을 만들 수 있으며 수동적으로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생각으로 건강한 입법을 만들고 현재의 잘못된 규제를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1 : http://www.dailian.co.kr/news/view/434456/?sc=naver

⑮ 김현경(군산대학교 해양학과)



6 월 4 일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그중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 살리겠다는 약속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더 이상 그 공약에 대한 성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공약은 약속이며, 약속은 지켜야 당연한 것이지만, 정치적인 약속의 공약에서는 다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일까요? 국민들의 신뢰는 높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실업이 지속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경제까지 흔들리는 때에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이 대두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떠한지 되돌아보고 경제를 살리는 정치란 무엇인지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4 월 24 일 제 84 차 월례토론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를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에 참가해주신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법적 간소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는 경쟁과 포퓰리즘에 빠져 경제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하며 "법적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살리지 못하면서 관련 종사자들에게 되려 피해만 입히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리덤팩토리 김정호 대표는 경제를 죽이는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특정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제도'를 들며 이러한 사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바른시민사회 이옥남 정치실장은 "정부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9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3 단계를 거치면 된다"며 법안통과 절차가 간단한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다양한 규제 입법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김기천 논설위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자각'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미국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티 파티 운동'과 같은 대중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바라보며 신랄하게 개선점과 보완점을 이야기해주신 전문위원 분들의 이야기는 결국 양측 간의 올바르고 굳은 신뢰가 기저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김기천 논설위원의 말에 적극 동의하며, 한편으로는 신뢰를 형성하는 기틀의 일련 과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닭과 달걀 중 무엇이 먼저인지를 따지는 논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선행과 국민들의 지지 중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정치를 이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이고, 국민은 정치를 신뢰해야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정치과정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선행과 국민들의 지지는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쪽이 앞서가거나 뒤처진다면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1 인당 GDP 의 43.6% 세금을 내는 프랑스인들은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증세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 인당 28.7%의 부담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르타블리에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정부와 국민의 신뢰관계가 있었기에 증세가 가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프랑스는 정치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을까요? 0%의 경제 성장률의 흑역사가 있었습니다.(2012 년), 하지만, 동년도에 역대 최고치의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소득수지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2013 년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0.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수치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경제 신뢰도는 높아지고 이에 따른 참여가 올라가고 있기에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부담을 지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를 위해 증세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기본적인 결과 도출이 없으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우수한 정치집단이 없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과 야당의 경쟁과 비난이 아닌 견제와 비판 속에서 상생하며 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국민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형성한 여론과의 접촉 빈도수가 늘어나게 되고 말이죠.

자연스러운 변화는 정치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들에게도 공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게시판을 활용하는 등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 좋은 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행정부처에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원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개선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한다면 행정적으로만 바라보았던 곳을 실제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젊은 대학생과 청년들은 SNS 활동을 통해 관공서와 정부기관에도 손쉽고 다양하게 손을 뻗쳐서 정보를 습득하고, 정치활동에 가담할 수 있으며 본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진행하는 월례토론회에 참석하여서 정치, 사회, 경제적 소양을 넓힐 수 있습니다.

제도적, 현상적으로 정치를 이행하는 국회의원들도 결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함께 도모하는 국가의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개인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경쟁적 체제에 물들어 자신의 것만 것 취하려고 했던 태도들이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도 무색하게 할 만큼의 행동들로 비쳐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과 국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서 국민이 만들어 집행하는 정치라는 것에 집중하여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선진 국가의 살아있는 경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⑯ 심성보(공주대학교 공업화학전공학과)



경제를 죽이는 정치, 포퓰리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이 있을 시기에 각종 선거의 후보자들은 수많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각종 공약들을 보면 실행 불가능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한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을 배제하고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의 형태를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는 지난 4 월 24 일 열린 4 월 월례토론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살리지 못하면서 대형마트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만 입히고 있다"며 "우리 나라 정치가 포퓰리즘과 정쟁에 빠져 경제를 어려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같은 규제가 '경제를 죽이는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옥남 바른시민사회 정치실장은 "정부가 법을 만들려면 9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3 단계만 거치면 된다"며 "이런 간단한 절차를 활용해 다양한 규제 입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서 일정 건수 이상으로 규제가 늘지 않도록 규제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천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무엇보다 국민의 자각이 필요하다."와 "미국 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티 파티 운동'처럼 대중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결국 '정치를 죽이는 정치'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포퓰리즘의 부정적 사례가 바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은 산업들이 발전하기는커녕 보호받기 전보다 낙후된 산업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제품의 품질은 낮추고 가격을 높은 상태로 유지해서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일자리도 늘지 않았으며 국내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자 외국 제품들에 의해 시장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중소기업에서는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정부 보호에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오늘날 실업률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 열병에 빠진 중소기업의 몰락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의정모니터를 통해, 상임위원회 별로 중점법안 처리 과정을 심사하고 규제법안이나 황당 법안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분석 등을 통한 국회의원의 정책심의 능력이나 정책대안 제시 능력, 이슈 제기 능력, 개혁성, 전문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참여가 높아져야 합니다. 현재의 대학생들은 몇 년 후 어른이 되어서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정치적 제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어릴 때 시행된 제도지만 결국 오늘날의 대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이 혼자 참여하는 것보다는 대학생 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참여인원을 쉽게 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원인 중 한 가지가 자신이 의견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들어주지도 않을 거라는 불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생 단체를 만든다면 정부에서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부담감도 덜 할 것이고 단체가 잘 운영된다면 대학생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입니다.



캠퍼스 내에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한대

즉 미래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은 정치적 무관심을 버리고 오늘날의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경제를 죽이는 정치를 경제를 살리는 정치로 변화시켜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⑰ 장윤석(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국 선진화포럼 제84차 월례토론회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보면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표를 얻기 위한 정책들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경제적으로 많은 규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많아지면서 경제적인 투자를 추락시키고 있고 이는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대형마트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본래의 취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반대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대형마트 입장에서 근무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품목별로 농수축산물과 같은 신선식품의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에게 타격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84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옥남 바른 시민사회 정치 실장은 다양한 규제 입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 대학원 특임교수는 포퓰리즘 정책을 없애기 위해서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진정한 리더가 나오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84 차 월례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올바른 경제성장을 이끌어줄 리더를 우리의 손으로 선출 한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권자들이 올바른 경제성장을 이끌어줄 리더를 선출할 때 3 가지를 기억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유권자들은 경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권자가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시행하지 못할 공약을 내세운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지식을 떠나 주변에서 시행하지 못 할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가 당선이 되었을 때 유권자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현명한 선택이 있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정치에 대한 지식을 쌓도록 지원을 해준다면 국민들에게 큰 시너지 효과가 작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학창시절 두 명의 반장 후보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햄버거를 돌리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표가 몰리며 반장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친구는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장으로 선출된 친구는 제대로 반을 이끌지 못하며 친구들의 질타를 받게 되었고 뒤처리는 부반장인 친구의 몫이 되었습니다. 부반장인 친구가 더 반장에 적합한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학창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햄버거 때문에 그 친구를 뽑은 건 실수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부반장을 했던 친구가 반장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를 나눕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폭넓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예로 의무휴일을 시행함으로써 무조건 좋다는 생각보다 의무휴일을 시행함으로써 겪게 될 문제점까지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이 시행됨에 따라서 근로자의 수가 줄고,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까지 생각하는 넓은 안목을 지닌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시장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미래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대학생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의 정치, 경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고 대학생들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올바른 리더의 선출로 경제를 죽이는 정치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⑱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한국선진화포럼 제 84차 월례토론회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정치권에서 당장 눈앞의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이 경제를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소수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훨씬 많은 정책들은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에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 월 (재)한국선진화포럼은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종찬 한국선진화포럼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창원 한성대 교수,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의 주제발표 후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김기천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토론발제로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들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유로 공약이 남발되는 잦은 선거, 극심한 정치 갈등, 그리고 의원입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치 풍토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먼저 최종찬 한국선진화포럼 정책위원장은 정치 혁신을 위해 분산돼 있는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포퓰리즘 입법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정치 부분에서도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사무국 내에 전문적인 규제심사 및 평가를 위한 보조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서 일정 건수 이상으로 규제가 늘지 않도록 규제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천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유권자로서 나라의 미래야 어떻게 됐든 표를 위해 국민에게 아부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나라의 장기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국민적 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규제가 정당한 경제활동을 막고 있으며 경제를 죽이는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혁파를 성공한다면 경제를 살리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정호 대표가 강조하신 규제혁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며, 지금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치의 방향은 규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닌 사다리를 놓아주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 나가고자 합니다.



균등한 기회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는 정치

우리사회에는 규제혁파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초기부터 규제혁파를 중심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친기업 정치인이라며 민심을 얻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저하시켜 해당 기업의 근로자 및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협력관계인 중소기업과 그에 속한 근로자들의 기회도 앗아가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뿐입니다. 결국 이익을 보는 사람은 없고 피해를 보는 사람만 있는 제도일 뿐입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언제나 결과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도 존재합니다. 정부가 패자를 도와야 한다는 명분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재분배하려 하거나 각종 규제를 만들어 국민의 생산과 소비의 자유를 빼앗는 일은 결국 경제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물론 빈곤층과 낙후된 기업을 충분히 구제하지도 못 합니다.

학급에서 성적 격차가 벌어졌을 때, 성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가 직접 나서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격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 그 자체를 이루는 데에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학력상승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라는 학교의 궁극적인 비전 달성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들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적 격차가 벌어졌을 때,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관여하기 보다 오히려 하위권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처럼, 정부도 상생사회를 위해 규제의 방법을 고안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격려하고 자극하여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의 인위적 분배나 각종 규제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치는 규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고 빈곤층이 다시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근시안적인 정치, 경제를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바른 판단력과 결정력을 갖춘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당장의 정치생명력과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기보다는 나라의 장기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국민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나오길, 또 그런 리더를 지지할 수 있는 국민의 안목과 혜안이 갖춰지길 바라봅니다.

⑲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한 나라 경제의 흥망성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기계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기면 외적 하드웨어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기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외적인 성장을 해도 내부 법, 제도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국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법, 제도의 입안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 범위가 단순히 입법 건수에 국한되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통한 지역구 편파적인 입법들이 남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4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개최한 제84차 월례토론회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라는 주제로 포퓰리즘적인 의원입법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분산되어 있는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포퓰리즘 입법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김정호 교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각이 필요, 책임 있는 유권자로서의 도덕심을 높여야 하고 진정한 리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창원 교수님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유로 선거와 정치적 갈등, 의원입법의 과도한 의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회의원의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김기천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포퓰리즘을 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명사들 가운데 바른 사회시민회의의 이옥남 정치실장의 시민단체, 언론,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의정활동 평가를 하는 의정모니터 기능의 강화안에 대해 더 논의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의정 모니터 강화가 더욱 구체화되고 한국 정치, 경제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가 주체들이 단순히 시민단체, 언론 등 특정화되지 않고 시민 전체로 그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투명화를 위한 모니터 기능 강화인데 평가 주체가 특정 집단이라면 이들의 평가 권한이 기득권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들 간 의정 활동과 관련한 정보, 지식이 상호 교류되어 '집단 지성'이 형성되고 이를 이용한 '시민 거버넌스(governance)'로 투명한 의정 활동 규제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집단지성이란 예를 들면 사람들이 특정 분야, 주제에 대한 지식 등을 공유하면서 이를 위키피디아처럼 다수 공유의 플랫폼에 등재하여 하나의 거대한 지식 pool이 형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 pool을 구성원들 모두 접하여 전체적인 지식수준 이상 상향평준화 된다면 비도덕적인 정치인들이 보여주었던 포퓰리즘점 공약 등에 속지 않는 분별력이 생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권자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올라가서 경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면 투표율이 올라가고 토론이 활성화되면서 편파적인 입법을 하는 의원들이 퇴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예로 서울시의 정책토론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서울시의 중요 현안이 무엇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를 시민들에게 직접 듣고, 정책을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의 존재로 인해서 서울시 내의 특정 지역 이해집단 세력들의 부당한 입법 추진 등이 저지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으로 평가 주체가 확대되면 그 안에서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비판 제기도 가능하지만 시민 거버넌스가 헤게모니 다툼 장이 아닌 공론의 장으로 기능할 경우 건설적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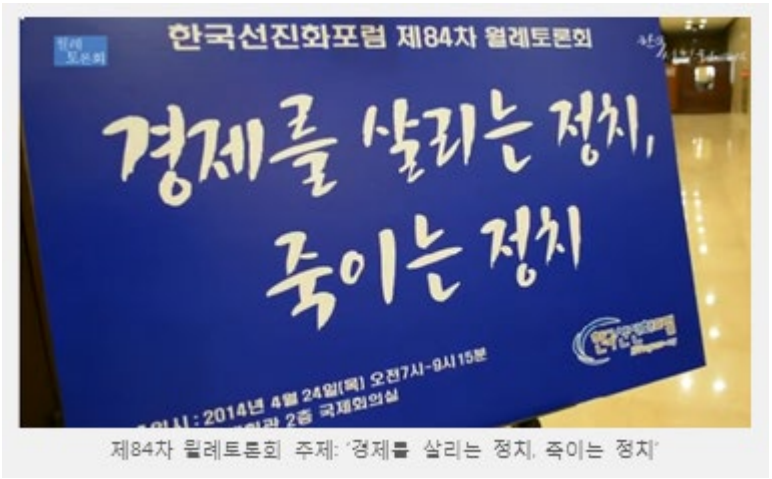
이렇듯 집단지성을 근간으로 형성된 시민 모니터링이 그 내부에서 소모적 논쟁으로 역기능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공론의 장으로 잘 이끄는 제도적 보완, 리더의 역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입법 남발의 문제가 시민 거버넌스의 모니터링 활성화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⑳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제84차 월례토론회 주제: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

한 국가 내에서 정치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당한 상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경제정책은 정치에 의해 좌우되고 그만큼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무분별하고 신중하지 못한 정책결정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고스란히 짐을 떠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개최한 제84차 월례토론회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라는 주제로 포퓰리즘적인 의원입법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분산되어 있는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포퓰리즘 입법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김정호 교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각이 필요, 책임 있는 유권자로서의 도덕심을 높여야 하고 진정한 리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창원 교수님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유로 선거와 정치적 갈등, 의원입법의 과도한 의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회의원의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김기천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포퓰리즘을 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대학생의 관점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리더로서 국회의원의 능력 평가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헌법상으로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만약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보다는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우선시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정당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규정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을 선출한 유권자인 국민들 마저 그러한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알면서도 형식상의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쏟아지고 막무가내식의 법안이 넘쳐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정치로 인해 경제가 죽어가는 것 또한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정치로 인해 죽어가는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당리당략과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정치구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때,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나아가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의식전환은 '마음먹기'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규제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원평가제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철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함으로,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 번,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국민의 대표로서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은 의지를 보입니다.

따라서 4년에 한 번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매년 의원평가제도를 통해 다음 총선을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률적인 급여제공이 아닌 차등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규제를 통해 매년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원평가제도를 통해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전 국민이 투명하게 확인하여 다음 총선의 출마 자격을 정당의 권한이 아닌 국민의 권한에 의해 주어지게 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혜택만큼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도 잘 이행하게 될 것 입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대표가 아닌, 정당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중요시된다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바른 의정활동까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민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국회의원들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리더들이 많아질 때, 선진 대한민국이 됩니다.

국민의 대표는 나라의 지도자, 즉 리더(leader)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리더(leader)의 자질을 갖춘 국민의 대표들이 정치를 이끌어 갈 때,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리더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게 되는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리더의 '자리'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주변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책임과 의무는 별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leader)는 리더(leader)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존경보다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야 하는 '자리'이며 더 많은 특권을 누릴 때가 아닌 막중한 책임과 그 무게를 짊어져 갈 때, 더 빛이 나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에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리더들이 많아지고 그들로 하여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성문(윤리교육 4) :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4 월 24 일 개최한 제 84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를 죽이는 정치의 한 유형인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원뿐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영역에서도 의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권자 중에서도 기성세대의 뒤를 이어 새로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역인 대학생들이 기존의 프레임에 물들기 전에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학내에서 자체적으로 유권자 의식 캠페인을 벌이거나, 인터넷 청원을 통해 이해관계와 인기영합주의에 좌우되지 않는 목소리를 낸다면, 정치에 건전한 시각과 민의 반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보완책은 무엇이 있을지 의견 나누고 싶습니다.

석신호(윤리교육 4) : 향후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서부터 의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현재 만연하고 있는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시하신 해결법은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의견이라 구체성이 부족하며 비현실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들의 경우 각종 스펙 쌓기, 학점 따기에 매몰되어 자신과 관계된 것 이외의 넓은 영역, 사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내에서 자체적으로 유권자 캠페인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건상 힘들 것입니다.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참여율과 실효성이 저조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병욱(윤리교육 4) : 하루하루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취직, 장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긍정적 영향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향에 대해 현 대학생들이 잘못이라거나 옳지 않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입니다.

때문에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유인물 혹은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공모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유권자 의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UCC 형태로나 수기, 소설, 사진전과 같은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공모전에 수상 시 주어지는 상금 혹은 경력 등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바람직한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정치를 위해 유권자들은 어떤 의식을 함양하고 있어야 하는지 대학생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숙의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학생 참가자들에게 바람직한 유권자 의식을 체화(體化)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언로(言路),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정복경(윤리교육 4) : 저는 SNS 를 활용한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활동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청년 대학생들은 종래의 일방적인 소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불필요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인물과도 소통할 수 있는 언로(言路)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세가 된 SNS 활동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편의성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정치와 유권자의식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존재했던 벽을 없애고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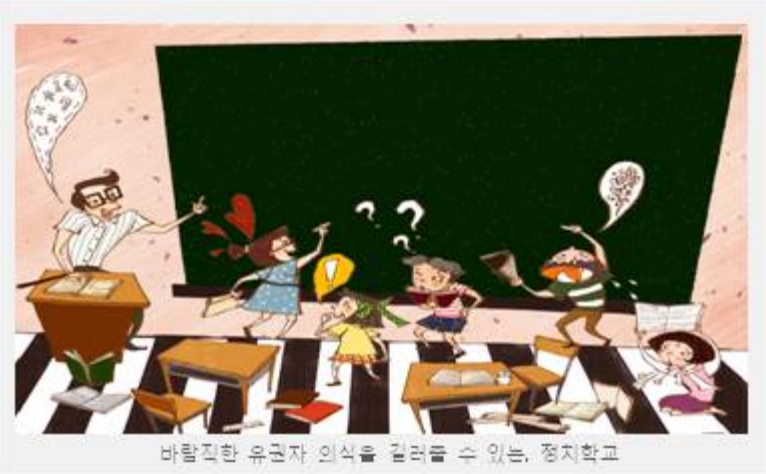
또한 이른바 '인증샷'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의식을 보여준다면,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계정에 연계되어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도록 퍼트리는, 이른바 '물결효과(riffle effect)'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성문(윤리교육 4) : 위와 같이 대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전을 열거나, SNS 를 이용한다는 방안들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병욱(윤리교육 4) :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될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대학생들로부터 유권자 의식의 개선을 통해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경제를 살리는 바람직한 정치로의 이행인 것인데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어 상금을 위해 혹은 이력서에 적을 한 줄을 얻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의식 있는 사람이 것을 보여주기 위해 SNS 를 이용하는 등의 행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복경(윤리교육 4) : 실제 4.11 총선에서 한 유권자는 투표는 하지 않고, 인증샷만 찍고 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례가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공모전과 SNS 를 진행하면서 항상 활동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석신호(윤리교육 4) : 대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유권자 의식을 키워주기 위해서 '정치학교'를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경우 일반 생활과 '정치'가 유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를 별개 영역으로 보고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관심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정치학교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정치란 무엇이며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바람직한 유권자 의식을 가져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교육하고 인식하게 한다면, 정치를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게 되어 보다 선진화된 유권자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식견 있는 언론인을 길러내기 위해 설립된 저널리즘스쿨이나, 일본에서 비전 있고 훌륭한 정치가 혹은 정치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마쓰시타 정경숙(松下 政經塾)과 같이 교육을 통해 개개인으로부터 의식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문(윤리교육 4) : 정치학교라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그 안에서의 교육을 통해 유권자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방안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의 특성상 일방적인 방향으로 경도되는 교육을 하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석신호(윤리교육 4) : 적절한 지적입니다. 때문에 우선 정치학교를 세우는 주체가 중요할 것입니다. 비영리적 성격을 가진 단체를 통해 설립하거나 혹은 민간 기업에서 후원을 받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엄격한 관민 합동 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치는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교육의 방향이

특정 가치관으로 경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일종의 정치 선전소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은 초보단계이기도 하고, 정치를 위한 어느 정도의 기본 소양을 갖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학교를 운영해 봄으로써 대학생 유권자들이 가져올 변화와 그 실효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문(윤리교육 4) : 지금까지 경제를 죽이는 정치인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를 지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생 유권자들의 의식 개선에 주목하여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우선 현재 대학생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들을 참여시켜 정치와 유권자 의식에 대한 숙고를 동반하게 할 수 있는 공모전, SNS 활용방안이 나왔습니다. 나아가 현재 일반 생활과 유리되어있는 정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의 방법을 통해 의식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학교' 설립 방안도 의견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본말전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치학교의 경우는 일방적인 정치적 가치관의 선전소가 되지않도록 주의하면서, 대학생에서부터 시작하는 유권자 의식의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임형윤, 권인성, 김영우, 김동하

서연우(국제학과 3):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4 월 24 일에 개최한 제 84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퓰리즘적인 정치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평가기준의 변경과 입법실명제,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사후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대학생들이 감시망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현재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가 한 해에 얼마만큼의 입법안을 통과시켰는지를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특정 입법안이 사회에 얼마만큼의 효용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입법 실명제를 도입하여 어느 법률을 어떤 정치인이 만들었는지를 밝힘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법률안이 효력을 지니기 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 법안이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는 사후 입법영향평가제도도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들도 가만히 뉴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할 용기와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지니고 계신가요?

임형윤(국제학과 3):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입법안들은 아무런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통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규제의 숫자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우리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포퓰리즘적인 입법안과 과잉입법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법안의 사전적인 분석과 사후적 대책

김동하(국제학과 3): 물론 저도 입법안들이 통과되기 전에 사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실제로 적용 후에도 사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경제성장률이나 경제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왔는지를 기준으로 특정 정책을 평가하고, 만약 의도했던 것과 달리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입법실명제의 경우, 정치인들의 이름과 같은 개인신상정보가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노출로 인하여 악성댓글로 인해 정치인들도 고통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인성(국제학과 2): 하지만, 정치인들은 선거, 기자회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미 노출된 상태이며, 김동하 학우가 말한 부분들은 다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정치인을 하기로 결심한 그 시점부터 개인의 신상정보가 대중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입법 실명제로 인해 이러한 노출이 과도하게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연우(국제학과 3): 네, 여러분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은 현재 우리 나라의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들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 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이 좋은 생각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대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임형윤(국제학과 3):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은 조직화겠죠. 아무래도 좋은 생각을 지니고 있더라도, 대학생들이 개인으로서 지니는 정치적인 영향력은 너무나도 작죠.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체를 구성하여, 정치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야겠죠.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대형마트에 대항하여 조직상권들이 똘똘 뭉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미미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녔지만, 이들이 뭉치면서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학생들도 단체를 구성한다면, 정치인들이 쉽게 무시할 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서연우(국제학과 3):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적할 수 있을까요?

임형윤(국제학과 3): 단체의 성격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국회와 연동되는 대학생 단체라면 국회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올릴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특정 정치인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도 하나의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권인성(국제학과 2): 그것 외에도 현재 서연우 학우가 하고 있는 선진화홍보대사 활동처럼, 특정 단체 하에 들어가 글이나 홍보활동을 통해 전체 국민의 의식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학교에서 잘못된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치를 감시하는 것도 국민의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김동하(국제학과 3): 그리고 현재 대학생들이 많은 유투브나 SNS 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유투브나 SNS 의 경우, 특정 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도달하기 용이하며, 아까 임형윤 학우가 말했던 것과 같이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SNS 의 경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너무 극단적인 의견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은 다소 조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히 다룰수만 있다면, 유투브나 SNS 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의견표명이나 감시도 좋은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서연우(국제학과 3):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직화, 편지, SNS, 유투브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주셨는데요. 이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이는 대안과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임형윤(국제학과 3): 저는 SNS 가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편지를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편지를 보내려면 글을 작성하고, 우체국으로 가서 붙이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 방법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파급효과가 미디어만큼 강력한 SNS 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김동하(국제학과 3): 그러나, 아까 위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SNS 은 무분별한 댓글, 악성 댓글, 익명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편지처럼 자기의 생각을 한 번 되짚어보고,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 현실적이면서도 좋은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인성(국제학과 2): 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사실, SNS 은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편지보다는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전자메일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임형윤 학우가 말했던 우체국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더불어 자신의 생각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전자메일이 위의 두 방안의 장점들을 잘 결합시킨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

서연우(국제학과 3):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SNS, 편지, 이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한 전자메일을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은 표퓰리즘적인 정치를 막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동의하셨고, 권인성 학우는 구체적으로 사전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학생들의 생각이 현실화되기 위한 SNS, 편지 등 다양한 방법들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나라의 정치도 포퓰리즘적인 요소들이 없어지고, 경제를 죽이는 것이 아닌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오상택, 유성렬, 임종호, 정원석

정원석(연대시생 4) :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선진화 연구모임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구모임의 주제는 포퓰리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4 월 월례토론회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등 많은 분들께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퓰리즘 정치가 경제를 죽이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발언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6.4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들 모두 자신의 지지율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들 중에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정책들도 있었지만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공약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포퓰리즘 규제는 경제의 악

포퓰리즘은 표심을 얻기 위한 국민들을 향한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이러한 정치의 결과는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여 한쪽의 손해를 바탕으로 다른 한 쪽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으로 인하여 법으로 포퓰리즘적 규제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훗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규제의 혜택을 받던 기업의 압박으로 인한 규제 완화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발전에는 도움이되지 않는 포퓰리즘 정치,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이제는 해결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 여러분들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타파를 위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임종효(연대생화학 석사) : 저는 포퓰리즘 정치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19 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1 인 1 표 선거권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도 1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같은 1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 인 1 표 방식이 포퓰리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성렬(연대생공 석사) :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인원 중 70%가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만 봐도 고학력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정치,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투표를 할 때 선거 공약을 보는 동안 이러한 정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많았습니다.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할 사람을 골라내는데 더 힘들었습니다.

정원석(연대시생 4) :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경제, 정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선진화 홍보대사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상훈 교수님께서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선거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후보자들 모두 안전을 위한 공약들을 내걸었지만 그러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고 아는 만큼 보이다 보니 공약들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학생들의 정치, 사회분야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상택(연대사회 석사) :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토론했었던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입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원석 학우가 말했던 것처럼 법을 통해서 보호를 해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것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을 예로 들면 청년고용할당제, 정년연장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직장을 보호해주려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로서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고용시장의 경직을 야기하고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의 양성은 지금 눈앞의 문제점만을 해결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규제를 완화해야 할 시점이 되었을 때에는 규제의 혜택을 보던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한쪽의 편을 들어주면서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을 먼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석(연대시생 4) : 그렇습니다. 포퓰리즘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그 밖의 경제를 죽이는 정치, 선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유성렬(연대생공 석사) : 저는 투표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투표율 60%를 넘기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보였는데요.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독려하는 많은 광고를 해왔고 사전투표제를 실시함으로써 부득이하게 투표를 못 하는 인구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2 번째로 높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였다고 하지만 사전투표제를 실시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대통령선거와 비슷해질 때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상택(연대사회 석사) :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로 인하여 20 대의 투표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선거를 생각해보면 5,60 대들의 보수층이 20 대보다 확실히 투표를 많이 하면서 20 대의 투표율로 인하여 당선이 결정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로 인하여 20 대의 투표율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되고 이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아갈 주역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종효(연대생화학 석사) : 연령대별 투표율보다 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라고 생각됩니다. 전부터 호남지역은 민주당 영남지역은 한나라당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살펴보아도 서울, 경기, 강원지역은 경합을 벌인 반면 호남과 영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식 투표는 올바른 선택을 막고 포퓰리즘적인 선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바른 선거를 통해 포퓰리즘 타파

정원석(연대시생 4) : 네 맞습니다. 투표율도 좀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아보고 지역주의만을 내세우며 선거에 임하는 자세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포퓰리즘 정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선자들은 표심만을 위하는 포퓰리즘적 공약과 정치를 하지 않아야 되겠고 이러한 포퓰리즘 정치를 타도할 수 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선거는 국민들이 정치인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포퓰리즘 정치를 타도하고 경제를 살려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④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김재순, 황윤지, 배현효, 김재윤

공현덕(경영 3) : 지금부터 삼육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4 월 24 일 개최한 제 84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경제를 죽이는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권자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후보자들의 행적과 업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철에 집으로 배송되는 홍보 책자에는 너무 간단한 내용만 실려있을 뿐 후보자들의 정확한 행적과 업적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국회 홈페이지나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다정(경영 4) : 얼마 전 SNS 를 통해 한 의원의 국회 회의 100% 출석률이 공개돼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의원의 이미지 많이 좋아졌겠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순(경영 3) : 저는 정보 공개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 선거 날은 그냥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투표도 안 하고 놀러 가거나 집에서 쉬기만 하니까요.

황윤지(경영 3) : 맞습니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나라가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게된 것이 30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번 대선 투표율을 보니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 투표율도 아마 전 대선에 비해 많이 올랐던 거였다고 하죠?

공현덕(경영 3) : 네, 유권자의 의식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헌호(경영 3) : 아까 말했던 후보자 안내문에 국회 회의 출석률과 그동안 발의했던 입법에 대해 싣게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좀 더 객관적인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요.

김재윤(경영 4) :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중 매체도 괜찮고, SNS 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다음이나 네이버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공현덕(경영 3) : 여러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유권자들에 대한 후보자 정보 전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주셨는데요, 저는 미래 우리 나라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대학생들의 의식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선거철이 된다고 해도 선거에 관심이 없고, 지역구의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값등록금 등 대학생들을 위한 법제가 이루어지려면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원하는 것은 많지만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다정(경영 4) :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발견한 서비스인데, '응답하라 국회의원'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원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메일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주는 서비스였는데요, 이러한 서비스가 평상시에도 계속 이용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의견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높은 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의견에 귀기울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이헌호(경영 3) :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인터넷에서 본 것인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사람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은 투표 용지에 일련번호를 적고 그 번호를 투표 후 복권 비슷한 형태로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돈을 지급하자는 내용인데, 언뜻 들으면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가 매번 선거철마다 투표 장려를 위해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섭외하고, 여러 캠페인을 통해 사용되는 금액이 10 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쓸 돈을 차라리 당첨금으로 이용하여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현덕(경영 3) : 확실히 투표율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위해서보단 그저 돈을 얻기 위해 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한

방법도 좋지만 우리 국민이 먼저, 그리고 대학생들이 먼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⑤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심영섭, 천중욱, 김민균, 김원아, 이소연, 서동진

김민균(신방 4) : 지금부터 광운/건국/고려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4 월 24 일 개최한 제 84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진화 홍보대사 오프라인 활동을 할 때 〈FTA 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자!〉는 취지의 활동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안타깝다고 느꼈던 것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FTA 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대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포퓰리즘적 정치형태가 만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치는 경제를 죽이는 정치가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국민감시제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정치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정치를 지양하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보완책은 무엇이 있을지 의견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김원아(식생 4) : 저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같은 것이 바로 포퓰리즘적 정치의 대표사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례로 조사해 보았던 것이 있는데, 면도기 사업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로 인해 면도기의 경쟁력은 높아지지 않았으며, 결국 해외 면도기 회사인 〈질레트〉만 수혜자가 되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면도기 중소기업도, 소비자들과 근로자들까지 피해를 받았던 대표적 사례로 기억이 됩니다. 국민감시제도를 본다면,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는 고발제도를 좀 더 폭넓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동진(문헌 4) : 국민감시제도의 고발제도를 폭넓게 시행하는 것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발제도 자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접하는 단편적인 정보들만 볼 뿐,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나올 수 있는 포퓰리즘적 정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심영섭(행정 4) :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생각보다 대학생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여타의 스펙, 학점, 취업과 자격증 등등의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천종욱(경영 4) : 대한민국의 국민은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부분적인 것에서만 동의합니다. 제 주변을 보아도, 밥먹을 때에 정치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고 있지 않나요? 정치는 결과적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우리 시대의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민균(신방 4) : 포퓰리즘적 정치가 국민적 무관심으로 인해 나오며, 이를 국민감시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소연(사복 4) : e-나라지표를 들어가서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즉, 대학진학률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은 다들 아시지요? 2013 년 기준 대학 취학률은 2013 년 70.7% (출처 : e-나라지표)였습니다. 만약 국민감시제도를 대학진학률이 이렇게 높은 것과 연관시켜 보면 어떨까요?

심영섭(행정 4) : 좋은 생각입니다. 대학 취학률이 높다는 것은 보통 부정적인 것을 활용할 때 쓰이지만, 이 현상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대학진학률과 연관시켜 본다면, 우리가 1 학년 때부터 필수적으로 듣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전공 이외 필수 교과목들이 있는데, 국민감시제도와 같은 것을 대학 필수 수업으로 도입하면 어떨까요?



프랑스처럼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프랑스에는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단순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 강당에 모여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민과 학자들을 프랑스에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서 나온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들이 곧 경제를 살리는 좋은 정치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연(사복 4) : 저도 그러한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문화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필수적 과목들이 하나의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서, 공원에서, 집안에서, 프랑스 곳곳에서 이러한 문화가 자연스러운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문화가, 국민감시제도가 자연스러워 진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를 살리는 좋은정치로 바람직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아(식생 4) : 국민감시제도란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학생들의 정치의 무관심이 문제라면, 필수교과목으로 국민감시제도를 대학 필수 수업으로 도입한다는 것도 훌륭한 해결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천종욱(경영 4) : 이를 좀 더 확대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확대를 시키면 어떨까요? 대학생들이 과제형식으로 국민감시제도 수업을 들은 것들을 정치에 대한 올바른 국민 관심향상으로 전파하는 방식들은요?

서동진(문헌 4) : 좋은 생각입니다만,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대학 필수 수업에서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누구나 참여하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수업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관점과 생각만 전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요.

나와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교화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협한 생각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것을 주의하면서 대학수업을 진행한다면, 관심이 없는 현 세대의 문제들을 양방향, 쌍방향적 관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연(사복 4) : 좋은 지적입니다. 이렇게 국민감시제도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다면 포퓰리즘적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다음 선거 때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서동진학우의 말처럼 주의해야 할 것을 항상 염두해 둔다면, 선순환적인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발점

심영섭(행정 4)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아진 국민적 관심은 정책 사후평가를 국민들이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리〉를 국민들이 합리적 심판자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이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민균(신방 4) : 지금까지 경제를 죽이는 정치인 포퓰리즘적 정치형태는 국민적 무관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국민감시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학 수업으로 국민감시제도를 도입하자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동시에 일방적인 편협한 관점과 생각 방지를 위해 수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우려에 대한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제를 죽이는 정치를 막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국민의 건전한 관심이 경제를 살리는 정치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3 차 광운/고려/건국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출처 :
사진 2 - http://youtu.be/AN9WOEZg5r8
사진 3,4 - http://youtu.be/Imx7vgTslyY

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김정아, 이예원, 백다혜, 현미란, 김수현

김수현(성신 지리 3): 지금부터 성신여자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4 월 24 일 개최한 제 84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를 죽이는 정치의 한 유형인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회 입법과정은 지나치게 간단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포퓰리즘적인 법안이 무작위로 통과되며 경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선진국의 사례를 본떠 의원 입법과정에서의 사전,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치행태에 대하여 각자가 생각한 원인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아(성신 지리 3): 저는 국회의원들의 생각, 즉 마인드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이익인 표만을 위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책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요?

이예원(성신 심리 3): 김정아 학생의 말에 동감하지만 단순히 국회의원의 문제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또한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신만의 이익, 소수만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의 니즈(needs)를 위해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한국은 너무나도 작은 단위의 지역구 의원으로 인해 작은 지역구만을 위한 정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지역이기주의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비와 핌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지역이기주의가 전체에게 피해를 준단 것은 알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당장 자신에게 끼쳐오는 것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문제죠. 단순히 국회의원만의 잘못이 아닌 국민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미란(성신 지리 3): 저는 김수현 학생의 말처럼 현재의 의원 입법과정이 포퓰리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합니다. 모두가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주의는 존재하고 이러한 이기주의는 일종의 본성이기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기주의라면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입법과정에서의 심사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한국의 입법과정은 정부입법 과정은 9 단계이지만 의원입법 과정은 3 단계로 매우 축소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입법과정에는 준비 과정에서 규제 심사 제도가 포함되어 있어 사전에 문제가 될 법안을 걸러낼 수 있지만 의원입법 과정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사전에 잘못된 법안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적 정책이 만연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요?

백다혜(성신 지리 3): 저는 잘못된 의원평가 제도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의원평가 방식에는 발의한 법안의 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법안을 누가 많이 발의했는가.'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작위 법안 발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도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의 입장으로 비춰본다면 교수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내주셨을 때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를 내는 것이 주제에 맞고, 완벽한 과제보다 점수를 더 잘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많이 내는 것이 성실도의 잣대라 할 수도 있지만 정작 강의와는 관련 없는, 알맹이는 없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과연 정말 성실한 것일까요?



단순히 표만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김수현(성신 지리 3): 네 분 모두 포퓰리즘적 정치행태의 원인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정아 학생은 국회의원의 의식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단순히 표만을 원하는 국회의원의 의식 문제가 포퓰리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예원 학생은 국회의원 뿐 아닌 국민의 의식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역구의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역이기주의로 꼽아주시며 포퓰리즘적 정책의 원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미란 학생은 저와 같이 의원입법과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입법과정 사전에 거름망 부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다혜 학생은 의원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법안발의 수만을 평가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잘못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통과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말씀해주신 원인을 토대로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예원(성신 심리 3): 저는 책임감 있는 국민 의식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란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과 국가 모두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소수의 이득만을 위해서가 아닌 전체를 위해 행동하여야 합니다.

김수현(성신 지리 3): 책임감 있는 국민 양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예원(성신 심리 3): 저는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처럼 어린 시절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가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어린 시절부터 확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회장, 부회장 선거가 바로 그 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의 선거는 일종의 인기투표입니다. 후보의 공약과 평소 행실을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시켜야 합니다.



의원입법 과정의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합니다

현미란(성신 지리 3): 저는 의원입법 과정에서의 사전, 사후심사제도가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법률안에 대한 자체 심의가 매우 엄정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층적인 심의와 분석을 통과한 법안들이 발의되며 가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법안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와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입법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인 포퓰리즘적인 법안을 줄이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김정아(성신 지리 3): 저는 국회의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일종의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신만의 이득인 표가 아닌 전체 국민, 전체 국가를 위해 활동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의원 활동 기간 동안 의원의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의원에게는 일정한 보상을 통한 당근을, 못하는 의원에게는 채찍을 주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백다혜(성신 지리 3): 저는 의원평가제도의 변화와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의 확보가 해결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의원 평가제도가 아니라 법안 발의 이후 그 법안의 결과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평가제도로는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유행법을 만드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기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평가를 중심으로 바꾼다면 쉽사리 포퓰리즘적인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의 확보 또한 필수적입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경제 전문인이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죠. 단순한 Follower 가 아닌 진정한 Leader 가 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들도 노력하는 의원을 지켜보고 응원하여야 합니다.

김수현(성신 지리 3): 네 분 모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각자 포퓰리즘적인 정치행태에 관한 해결방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예원 학생은 가정과 학교의 교육으로 책임감 있는 국민의식 양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현미란 학생은 의원입법 과정에서의 사전, 사후 평가제도를 해결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아 학생은 국회의원의 의식 변화를 위한 의무교육과 의원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다혜 학생은 법안 발의 후 결과를 통한 의원평가제도의 변화와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의 확보를 해결책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은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되어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나눠주신 성신여대 학생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연구모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⑦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이슬기, 김희정, 김수연, 문정인

김희정 (숙대영문 2): 지금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의 주제는 지난 4 월 24 일에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개최한 월례토론회 '경제를 살리는 정리, 죽이는 정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볼 예정인데요,

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는 안일한 태도를 지양하고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며 법안을 마련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그 반대의 국회의원들을 조사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면 경제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나오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보았는데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수연(숙명영문 3): 김희정 학우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들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분명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시민단체들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만약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다면 좋은 평가를 주게 되지 않을까요?

이슬기(숙대영문 3): 저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6.4 선거에 관련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단체들이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을 직접 자신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의도 정책 연구원에서는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치가들을 감시,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한다고 하면 저희는 시민단체들이 과연 공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서포터즈로서 시민단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희정(숙대영문 2): 제가 제시했던 시민단체들의 정치가들에 대한 평가에 관련하여, 그렇다면 공정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 또한 중요하지만 시민단체들 또한 스스로 공정한 평가를 해나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뒷받침 되어야겠습니다.

김수연(숙대영문 2): 저는 발의한 법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법안을 제시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딴 정책 명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만큼 더욱 성심 성의껏 생각해보고 검토한 후에 제시하게 되지 않을까요?

김희정 학우가 발의되고 있는 법안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법안의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자신에 대한 평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합니다.

김희정(숙대영문 2): 법안의 발의한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정책 명을 지음으로써 정치가들로 하여금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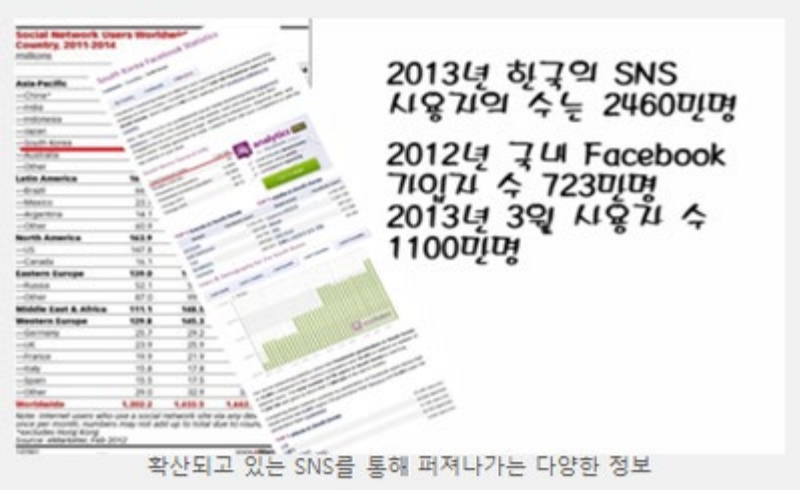
문정인(숙대영문 3): 저는 정치가보다는 투표를 하는 유권자, 특히 대학생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치가에 표를 던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았는데요, 이를 위해 대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치가란?'이라는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숙명여자대학교에는 핵심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과학, 예술, 인문 등 7 개의 영역으로 교양을 분류하고 각 영역 별로 1 개 이상의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법안, 올바른 정치가들의 자세와 같은 교양과목을 이렇게 필수 교양으로 지정해놓는다면 대학생들이 올바른 정치관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객관적인 자세로 정치가들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선거과정에 있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김희정(숙대영문 2): 저희 학교 말고도 모든 대학교에서 저희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 해당하는 교양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이러한 교양 과목을 통해 올바른 정치관을 확립하게 된다면 올바른 유권자는 물론 훗날 올바른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도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수연(숙대영문 3): 저는 SNS 에 관해서도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많은 대학생들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확실하지 않은 정보나, 편향된 의견만을 보내는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확산되고 있는 SNS를 통해 퍼져나가는 다양한 정보

저번에 중 3 인 제 사촌동생이 정치에 관련하여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페이스북의 무분별한 정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몸소 깨달은 바 있었습니다. 이런 SNS 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르지 못한 정치관을 가지게 합니다.

김희정(숙대영문 2): SNS 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부정적 영향이 아닌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수연(숙대영문 3): 제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글을 올리게 되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기에 앞서 양 측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쪽에 치우쳐진 편향된 사고가 아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김희정(숙대영문 2):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 쪽의 의견이 아닌 양 측의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게 함으로써 SNS 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6.4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공약을 내세우는 모습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은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과연 무분별한 복지 그리고 대기업을 죽이는 공약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말한 올바른 정치가에 대한 교양수업, 한 쪽에 치우쳐지지 않은 SNS 페이지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치가들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시민단체를 감시하는 서포터즈로서의 대학생의 활동, 법안을 발의한 정치가의 이름을 딴 정책명 등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치가를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치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가를 선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경제를 죽이는 정치를 펼치는 정치가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는 정치가가 어떻게 선출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http://www.youtube.com/watch?v=MA3N-f5RxSM

⑧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남아영(교육학 4), 김현아(교육학 4), 황지현(교육학 4), 서유진(교육학 4), 이보람(교육학 4), 최경원(교육학 4)

남아영(교육학 4) :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4 월 24 일 개최한 제 84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위해, 특히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도덕감정 함양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를 위해 선진국 독일의 정치교육을 본받아 국가적인 정치교육의 확대와 시민단체를 활용한 도덕적 판단에 기반한 정치경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독일의 정치 교육과 같이 관·정·민이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원적인 교육주체를 활용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정치 교육의 기회 제공과 더불어 정치 관련 동아리나 의정활동 감시 및 평가 등과 연계된 시민단체 활동을 장려하는 등의 방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처럼 '교육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보람(교육학 4) : 저는 유권자의 도덕감정 함양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된 후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복지를 원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을 생각해보면 세금을 냈지만 본인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범국민적으로 올바르게 복지가 분배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때 비로소 내고픈 마음이 생기는 거죠. 즉,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항이 투명성 있게 공개될 때, 저절로 유권자들의 도덕감정을 함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원(교육학 4) : 저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신뢰가 부족하니까 정치에 대한 흥미 역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구조적인 본보기 역시 존재하니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꺼리는 거죠.

서유진(교육학 4) : 투명성을 보장하고 신뢰를 얻으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애초에 정치적인 관심이 적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나쁘고 흥미가 없는 이들은 아예 멀어져 버리니까요.

우선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민성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훈련이고 연습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선거철이나 정치 현안이 있을 때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증진시켜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앞서 말했듯 정치교육의 확대 역시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최경원(교육학 4) : 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나에게 맞는 후보는?'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에 놀랐어요. 파벌이나 정치색에 의해 막연히 갖고 있던 부분과 달리 공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완전히 다른 후보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처럼 공약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재미라는 요소가 첨가되어야지만 우선적으로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황지현(교육학 4) : 실제로 우리 정치 교육을 돌아보면 도덕이나 사회 교과에서만 공통적으로 시민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내용 역시 추상적이다 보니 실제적 지식은 가르치는 부분이 무척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지적인 부분과 정의적 부분 역시 공존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요.

방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교육은 단순 암기 위주인데 영국의 써머힐 학교의 모습을 보면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는 전교회의를 통해 어릴 때부터 규칙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 삶 속의 정치죠. 이렇게 실질적인 경험이 정치를 관심 갖게 하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험 중심인 상황에서 규칙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니까요.

김현아(교육학 4) :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에요. 시민의 주체 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교과서에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내용이 지나치게 지시적인 성향을 보여요. 우리 현실은 다양한 이념이 맞부딪히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모습인데 너무 무결의 상태만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보람(교육학 4) : 그런데 아무래도 교육이 공적인 영역이다 보니 모든 이념을 아우르기도 어렵고 취사선택하기도 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인지적과 정의적인 측면이 모두 잘 이루어진 사례를 생각해봤는데요.

정치 현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선진국의 혁신학교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흥미를 가지려면 참여되어 있고 영향력을 가졌다는 인식이 필요한데 이처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는 방식이 주체의식이 생길 수 있는 교육이지 않을까 해요.

남아영(이화교육 4) : 여러분들께서 현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은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추가로 오로지 지식적인 부분에 멈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증진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지요.

따라서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 '독일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에서 정치교육을 총괄적으로 기획 및 재정지원을 하며 '베를린 주정치교육원(Berliner Landeszentrale)'과 같은 15 개의 주정치교육원, 여러 연구단체, 정당재단, 시민단체, 기업 등이 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역시 국가를 중심으로 지자체에 정치교육원을 두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유진(교육학 4) : 네, 동의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접근성의 문제와 함께 자주 노출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덧붙여 정치교육 시간에 신문을 읽게 하여 공부하는 NIE(Newspaper in Education) 방식을 좀 더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치교육이 딱딱하게 흐를 수 있으니 이를 막는 차원에서요.

최경원(교육학 4) :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험생 시절을 돌아봤을 때 저 역시 여러 종류의 신문을 읽으면서 학우들과 토론한 경험이 무척 재미있었어요. 지금 '선진화 연구모임'처럼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관심을 증진시켜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먼저 교사가 본보기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보람(교육학 4) : 아예 학교 차원에서 토의시간이 배당되는 게 일정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경험을 늘려주려면 실제로 정치라는 게 무언가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요. 앞서 황지현 학우가 말했듯 자율적인 부분을 분명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학교 시간표를 보면 주로 공부시간으로 채워져 있기에, 자유로운 토론 시간도 부족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직접 학습할 수 있는 게 적다고 봐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운영 교육 역시 병행되어야겠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지현(교육학 4) : 제가 이번에 교육실습을 다녀온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1 학년이 명상, 2 학년이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학생들은 이전 경험으로 인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견 교류가 가능해졌고요. 평가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교사가 잘 중재할 수 있게 유도한다면 유권자가 도덕감정을 함양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남아영(교육학 4) :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 예비유권자인 학생들이 도덕감정을 함양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먼저 우리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면 대학생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문제가 번번이 제시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제 주변을 보면 투표와 같은 정치 참여 기회를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에 저는 정치에 대해 논의하는 동아리나 정치 인식 확대 동아리가 학교마다 있다면 어떨까 생각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원 (교육학 4) : 요즘 학생들이 동아리를 하는 걸 보면 대부분이 소위 스펙을 마련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취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아마 많은 이들이 참여하지 않지 않을까요? 동아리 자체는 무척 좋은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요. 실제로 대학생 동아리가 있어도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고 부정적인 시각을 자아내요.

서유진(교육학 4) : 대학생 동아리보다 일회성을 강조하는 게 상대적으로 참여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늘 참여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일회성이 나을 듯 해요. 아무래도 이름 걸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보거든요. 드러나지 않음에 대한 안정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보람(교육학 4) : 성인교육, 평생교육의 측면에서도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오로지 대학생의 관점에서 증진하기보다는 모든 연령의 참여를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니까요. 특히 지역감정이 강하고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것이 다수에게 만연하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병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현아(교육학 4) : 포퓰리즘에 대해 생각해 보면 확실히 정치인들이 발의는 많이 하는데 유의미한 게 적은 것 같아요. 정치인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 평가가 도입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건 큰 문제니까요. 신뢰의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하고 입법 영향 규제 평가가 이야기되는데 이처럼 질적인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이보람 학우

이보람(교육학 4) : 맞아요. 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연구처럼 발의한 국회의원을 1:1 로 감시하는 것 필요해요.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적인 부분에 치우쳐요. 1:1 사례를 늘려 다수의 사람이 한 사람을 꾸준히 관찰하는 방안의 타협점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황지현(교육학 4) : 최근 사범대에는 교직인적성시험이 도입되었어요. 이처럼 본보기가 될 사람들에게 기본 소양이 확보되었는가에 대한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 역시

필요하다고 봐요.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해주기 위한 시도 역시 병행되어야 더욱 의미 있는 참여가 늘지 않을까요?

남아영(이화교육 4) :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관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교육적 접근을 토대로 한 유권자의 도덕감정 함양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하여 정치교육의 확대 및 개선을 위한 교육적 방안으로는 첫째로, 정치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민성 기르는 노력으로 정치교육의 전체적인 시수를 증가하는 방안이 이야기되었고 둘째로, 정치교육에서 인지적인 부분과 정의적인 부분이 공존하는 교육내용의 개선에 대해 제시해주셨습니다.

셋째로, 독일의 정치교육 사례를 보아 우리나라 역시 국가를 중심으로 지자체에 정치교육원을 두는 방안을 이야기하셨으며 넷째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Case Study 를 하여 스스로 참여되고 있고 이에 영향력이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맞는 후보는?'과 같이 재미를 유발하는 공약에 대한 객관적 시각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주셨습니다.

이어 이루어진 도덕적 정치경험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로, 시민의 주체의식 형성을 위해 영국의 써머힐 학교의 전교회의와 같이 자율성을 양성하려는 시도 역시 증진해야 한다고 지적해주셨으며 둘째로, 실질적 현안을 경험하기 위한 NIE(Newspaper in Education) 교육방법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과 시간 중 정규 토의 시간을 배당하는 방법과 이를 위한 교사의 운영교육 병행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그 외의 방안으로 첫째로, 정치 동아리와 같이 정치적 논의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 둘째로, 드러나지 않음에 대한 안정감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일회성 정치 참여 기회를 증진, 셋째로, 전 연령에 대한 정치교육 확대도 논의되었습니다. 이어 넷째로, 정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투명성 있는 공지를 바탕으로 한 신뢰감 형성과 다섯째, 정치인에 대한 기본 소양 평가 제도 도입 및 정치인 평가의 질적인 보완책 마련 역시 이야기되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도덕감정 함양과 그의 기반이 되는 교육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치교육과 정치경험의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인 해결방안보다는 여러 의견을 교류하는 데에만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미흡하지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연구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⑨ 성균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배하연, 이명은, 김수연, 안예은, 이재현

배하연(교육 3): 성균관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 번째 연구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 월 24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하는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라는 주제의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5 명의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 우리 정치사회에 만연해 있는 포퓰리즘 정치 현실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셨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요즘 더욱, 당장 눈 앞의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약이 남발되는 선거와 의원입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치 풍토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정치 행태가 될 수 있겠지요.

저는 이에 대해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구성원 즉, 유권자와 정치인의 도덕감정과 책임감을 확보하여 정치사회 전체를 위한 부분의 안정과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학생의 역할에 주목하여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 구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는 대학생들과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입법 발의와 정책 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입법서비스의 장을 말합니다. 대학생들의 공감능력과 SNS 를 통한 소통능력은 범국민적인 정치적 관심을 형성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인재로의 대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는 정치사회 구성원의 현명함과 책임감이 바탕이 된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와 같은 20 대의 정치 직접 참여는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고 정치인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 유권자 간 정치인 간의 균형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상적 실천모델을 계획·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제시한 대학생 정치 참여 단체,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권자와 정치인의 균형의 좋은 예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이명은(교육 3): 전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 의 시행을 찬성해요. 시민의식을 가진 많은 대학생들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정치사회에서의 직접적 피드백과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몇 달 전,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통해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볼 때,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해요.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는 개별 국회의원별 입법활동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대학생들이 입법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김수연(교육 3): 앞서 이명은 학우가 언급한 것처럼 요즘 대학생들 중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기르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현 우리 정치 사회에서는 법안을 내는 것에 대한 큰 규제가 없어 무분별한 입법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과 상이한 법안이 상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법안에 대해 평가하고 그들의 일방적인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는 그 점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이고 사회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대학생들이 법안에 대해 공부하며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의 시각이나 정보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학생들을 지도할만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집단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집단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또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겠지요.

이재현(교육 3): 앞서 두 학우가 요즘 대학생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를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20 대의 정치 참여율은 사회적으로 우려가 될 정도로 저조합니다. 정치에 대한 참여도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투표율인데, 20 대의 투표율은 전 세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요즘 우리사회의 대학생들이 정치 참여에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20 대가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소극적 정치참여는 나라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가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하연(교육 3): 자신들이 주체가 된 정치 참여 활동에 대학생들이 많은 호응을 보낼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SNS 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 성향과 신념을 공유했는데,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학생들에게 국회의원 입법 현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긍정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이명은(교육 3): 국회의원들에 대해 평가할 뿐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고 그 결과는 SNS 를 통해 공개한다면 직접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대학생들뿐 아니라 그 결과를 공유하는 많은 대학생들의 정치참여율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예은 (교육 3): 저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신분을 두고 만들어진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특정대상만을 위한 위원회는 입법과잉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원래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대학생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대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약을 내세우며 지금 당장을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쉽게 동조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SNS 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대로 된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유행 따라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어요.

때문에 만약 대학생 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면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비판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사고를 가진 대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그 다음 문제겠지요.

김수연(교육 3): 안예은 학우가 말씀하신 것도 공감합니다만 그건 일부 학생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대학생의 SNS 활용 능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 대는 SNS 를 통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는 연령대입니다. 대학생들이 SNS 를 통해 주고받는 정보는 다른 대중매체들과는 달리 자유롭고 다양하며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라온다는 장점이 있지요.

대학생들에게 의원입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SNS 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형성되는 여론은 국회의원들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교육 3): 물론 대학생들이 의원입법평가에 참여하는 과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예은 학우가 언급한 것처럼 정보의 정확성에 상관없이 자극적인 소재일수록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되는 SNS 의 속성상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SNS 를 통한 정보 전달은 파급력이 높습니다. 객관성과 책임감을 잃지 않는 참여가 동반된다면 국회의원들과 대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입니다.

배하연(교육 3): 대부분의 학우들이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는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높여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사회비판적 시각을 기르게 한다고 말씀해 주었는데요.

학우들께서는 각각 정치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정치 참여도가 낮은 대학생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가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의견 제시 해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의 SNS 를 통한 공감능력이 여론을 그 때, 그 때 생성하고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자극적인 법안에 대해 쉽게 동요하는 대학생들의 특성이 오히려 해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을 특정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는 결국 포퓰리즘 정책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를 구성하는 대학생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정치 참여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한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 이외에 포퓰리즘 정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이명은(교육 3): 유권자인 시민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요가 있는 한 공급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기성 질서나 정치 엘리트에 대한 강한 불신과 심지어는 혐오까지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심리상태와 처지를 해결하지 않는 한 포퓰리즘 정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수요'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시민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포퓰리즘 정치는 나라를 망치는 길임을 먼저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주의나 사익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정치나 국민통합 실천에 적절한 후보자를 뽑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권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시민교육이 필요

김수연(교육 3): 맞습니다.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견해를 공유하면서 자기보다 나은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탐구하려는 적극성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이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행해야 합니다. 먼저, 의무교육인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민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민교육이 도덕교과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도덕교과는 '윤리'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여 구성되어있을 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민교과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교과에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유도합니다. 아이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진적으로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룸으로써 참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명은(교육 3): 또한, 초·중·고등학생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시민이란 어떤 것인지,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등 일반대중교육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민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이 공공이성을 갖고 이를 통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정치를 바라본다면, 포퓰리즘 정책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교육 3): 앞서 두 학우가 유권자의 시민의식 개선 방안으로 교육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국회의원의 입법 횟수 제한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적 과잉 입법은 입법 유권자들의 관심과 선호를 받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과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 가장 모범적인 방법이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효과적으로 포퓰리즘적 과잉 입법을 막는 방법은 국회의원의 입법 횟수를 제한하여 내실이 없는 입법을 막은 후, 점차적으로 인식을 변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예은(교육 3): 저도 이재현 학우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입법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실효성, 실제 어떻게 시행됐는지 구체적인 항목을 통해 점수를 매겨 평가를 한 다음 그것을 공개해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 기본 점수가 넘지 못한 사람들은 후보 등록에서 제외시키며 또한 그 점수를 통해서 국민들이 후보들을 보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법도 이용될 수 있겠지요. 공약을 지키지 않은 후보들은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신중하게 새로운 입법을 제시하게 되며 그 법안이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앞선 두 학우의 의견처럼 장기적인 측면에서 방안을 모색해보면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며 정직성과 실천성에 대한 측면을 더 중요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하연(교육 3):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학우분들은 유권자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먼저, 유권자들의 시민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주의나 사익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정치나 국민통합 실천에 적절한 후보자를 뽑으려는 자세가 올바른 정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프랑스의 시민교육 과정을 예시로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도덕교과에 포함되어 있는 협소한 내용이 아닌, 전문적 내용의 시민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의 의식 전환,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근본적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학우들의 의견 중 정치인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규제도 있었습니다. 인식전환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입법횟수를 제한하고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위해서는 유권자와 정치인 개개인의 도덕감정, 책임감과 같은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도 동반되어야 하겠지요. 앞서 제시한 '의원입법평가대학생위원회' 등의 장치는 입법과정에서의 투명함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책임감과 양심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은 포퓰리즘적 의원입법 규제를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체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바른 정치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시민교육과 더불어 신중하고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우리의 정치사회가 건전하고 아름답게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왼쪽부터 김보경(경영4),이고운(프랑스어문4),군예현(프랑스어문4),서태준(경영3),박장수(경영3)

이승창(경영 3) : 지금부터 성균관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4 월 24 일 개최한 제 84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경제를 죽이는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포퓰리즘 공약이 민중의 관심을 이용한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민중의 관심을 포퓰리즘 공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예시로 선거철 각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독립된 전문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전문기관은 각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공약의 타당성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고운(프랑스어문 4) : 일반 유권자들이 전문적으로 공약의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문기구가 설치된다면 국민이 더 의미가 있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정치인 역시 자신의 공약이 공신력 있게 평가된다는 생각에 더 신중하게 공약을 내세울 것입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퇴역 외교관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박장수(경영 3) :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데는 찬성입니다. 다만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가지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면 포퓰리즘 정책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정치적으로 독립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연대처럼 자발적으로 유권자가 조직하는 형식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보경(경영 4) : 저는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소 회의적입니다. 국가가 만들어도, 국민이 만들어도 그 구성원은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띠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승창(경영 3) : 공약검토기구를 설치하는 데 많은 신중을 기해서 기구의 성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유권자에게 일방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연대의 성격처럼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공약검토기구를 결성하여 최대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동시에 유권자가 투표하는 데 참고자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예현(프랑스어문 4) : 저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포퓰리즘 정책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문의 어디에도 선거철에 후보자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어떤 입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선거철에는 공약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공약의 잘잘못을 구분하기 보다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섹션을 따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창(경영 3) : 그렇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구를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라는 점에서 대학생들도 경제를 죽이는 포퓰리즘 공약이 무엇인지 주의를 가지고 꾸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가 대학생 연합 학회를 결성하여 경제와 정치에 관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제를 죽이는 포퓰리즘 악법 해결은 대학생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보경(경영 4) : 저는 며칠 전 뉴스에서 국회의원 발의안에 대해 재원확보 대책을 제시하는 방안과 관련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정책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정책처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발의안이 좀 더 현실적이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정책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태준(경영 3) : 저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내세우는 공약과 입법의 기대효과와 실제효과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크게 다르고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 정치활동에 제약을 두는 방법을 고려해 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내세운 공약이 악영향을 가져올 경우에 자신의 경력에 위협요소가 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정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창(경영 3) :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부분에서 이후에 정치적 활동을 제약할 때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거활동을 할 경우에 각종 홍보수단에 처음 출마할 경우를 제외하고

발의안과 내세운 공약 대비 통과율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한다면 좀 더 신중한 정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창(경영 3) : 오늘은 경제적 선진화를 가로막는 포퓰리즘 정책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중심으로 토론해 보았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전문검토기구 설치, 예산정책처 지원, 미디어의 활용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근본적인 해결은 정치인들의 의식개선을 통한 선진화된 정치문화 달성일 것입니다.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의 자발적인 의식개선 없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의 표심보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 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신재연, 오혜린, 이윤경, 이덕주, 홍상범, 이찬열

송경남(경영 4): 사단법인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는 지난 4 월 24 일,제 8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경제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 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통해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회와 입법은 무엇인가요? 본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비판적인 행정 통제를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우리 사회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퓰리즘을 두고 민주주의 숙명이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포퓰리즘은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활동'을 말합니다. 정치를 하는 데에 있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국회의 포퓰리즘적 입법은 국민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특정 집단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의 입맛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특정집단의 입맛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수많은 포퓰리즘적 입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적 과잉입법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설치 함으로써 올바른 입법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진화 연구모임은 포퓰리즘식 과잉 입법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경남(경영 4): 포퓰리즘식 과잉 입법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저는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 의 공정성과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규제영향평가를 결합한 독자적인 입법규제 조직 결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중립에서 서서 바라보는 공정성을 지닌 판단력과 '규제영향평가제'의 입법규제 시스템을 결한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윤경(아동 3): 저는 먼저 입법 규제를 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기에 앞서 왜 국회의원들이 과잉입법을 하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과잉 입법을 하는 이유는 다음 번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위해서 일 것입니다. 득표율을 위해 특정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포퓰리즘식 과잉 입법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퓰리즘식 과잉입법규제를 제도적인 장치보다는 국회의원의 과잉입법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포퓰리즘식 과잉입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개인별 입법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덕주(행정 3): 입법수를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잉 자체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포퓰리즘식 입법의 제한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제안하는 입법안을 평가하여 점수로 환산하여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오혜린(아동 3): 저는 이덕주 학우의 제안과 더불어 점수를 환산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입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입법이므로 국회의원들의 입법안을 SNS 나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평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집단의 선호에 따라 입법의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많은 수의 국민이 참여한다면 이러한 것은 평균을 나타나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연(경영 3): 그러나 국민들에게 평가를 맡기게 되면 다시금 국민들의 진정한 행복이 아닌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 눈치를 보는 포퓰리즘이 근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입법을 평가하는 중복되고 분산된 여러 기관들의 기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의 입법조사처에서 모든 분야의 입법을 평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규제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인, 예를 들어 국가의 세금을 총괄하는 기관인 국세청에서 세금과 관련된 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각에 해당되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평가함으로서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이며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상범(경영 4): 저 또한 신재연 학우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단순히 입법수를 정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의 입법들을 평가하여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입법의 수가 일정 수를 넘게 될 경우,

즉 포퓰리즘식 입법이 일정수를 도달하게 되면 다음 해에 국회의원의 입법을 제한하는 법적인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법을 하는 경우 더욱 신중할 수 있게 되고, 포퓰리즘식 입법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찬열(법 3): 이준한 학우의 의견이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나 포퓰리즘식 입법이 아닌, 건강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규제뿐만 아니라 보상을 통해 건강한 입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1 년 동안의 입법을 평가하여 국가의 발전에 도움되는 데 가장 이바지한 역할을 한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수여하여 건강한 입법활동을 장려하여 포퓰리즘식 입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경남(경영 4): 지금까지 포퓰리즘식 과잉입법 규제에 대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먼저 입법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포퓰리즘식 입법 제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에게 입법에 대한 평가를 맡기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맡기게 되면 다시금 입법이 국민에 입맛을 맞추게 되는 포퓰리즘이 될 수 있으므로 분산되어 있는 기관들을 통합하고 다시금 전문적인 기관으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준한 학우는 이것을 토대로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평가하여 포퓰리즘식 입법이 많은 경우 다음 해에 입법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입법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찬열 학우는 제도적인 부분을 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포퓰리즘식 입법이 아닌, 건강한 입법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사회의 숙명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퓰리즘이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특정집단의 목소리를 듣고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포퓰리즘은 부정적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국회의 역할과 국회의원을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⑪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전용택, 오민석, 유하정, 주연아

주연아(경영 3): 오늘은 지난 4월 월례토론회의 주제였던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의 토론내용을 기반으로 한 제 3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유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의 입법 내용은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심한 경우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는 경우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지요.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대학생인 우리의 입장에서 정치인들의 입법이 특정 집단의 이해만을 충족시킴으로써 입법이 '포퓰리즘'적 도구로 쓰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즉,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진정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민석(생명과학 4): 특정 집단만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입법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닐까 생각해요.

잘한 입법활동에는 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응당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생인 우리들의 학교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기 중에 착실히 수업에 참석하고,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그에 합당한 좋은 성적을 받잖아요? 반대로 수업에 지각하거나 결석을 하면 '감점'을 받게 되고요.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책임감 없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하정(생명과학 1) : 하지만 단순히 점수만 매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오민석 학우가 빗대어 말씀해 주신 '대학생'의 학교생활을 예로 활용하자면 대학생은 각 과제, 출석, 시험에 따른

점수가 주어지고 이것이 합산되어 학기 말에 '학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대학생인 우리에게 학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미래의 '취업', '대학원 진학' 등에서 평가되는 '성실성 평가'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매겨진 점수 또한 '연봉' 등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활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임금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라던지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오민석(생명과학 4):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임금'을 점수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요소로서 활용하는 것은 그다지 효력이 없을 것 같네요. '임금'이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면 훌륭한 입법활동을 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은 연금도 받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는 부분은 못될 것 같은데요.

주연아(경영 3): 제가 생각한 요소는 이렇게 받은 점수가 차후 '선거'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안 좋은 점수를 받는 등 입법활동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다음 선거 때 출마하는 데 핸디캡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하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까 오히려 입법활동을 아예 안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되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입법을 제안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받은 좋은 점수가 '신뢰할 만한 정치인' 이라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다음 선거 때 '일 잘하는' 의원으로 다시 한번 신임을 받을 수 있다든지요.



포퓰리즘에 의존한 입법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용택(융합전자공학 3): 제가 생각한 방안은 '국회의원의 이름을 건 법안'을 제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전용택 법'이 되는 것이겠지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법이니까 법안을 본격적으로 제안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고성헌(자연환경공학 3):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할 테고, 평가제도도 필요하겠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타운미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모여 법안의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요. 그런 토의과정을 통해 입법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누가 제안한 법안인지를 알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일 테니까요. 우리도 특정 법안 통과에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좀 더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요.

주연아(경영 3):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입법활동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정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인 만큼 호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다수의 국민에게 선택을 받으려다 보니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법안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의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무조건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 진정 해당 입법안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현실성은 있을 것인지를 다각도로 평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유권자의 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유하정(생명과학 1) :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하는 현재의 기준에 무엇보다 큰 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평가요소에는 응당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 인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하는 요소는 '정량적' 부분에만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즉, 얼마나 제대로 된 법안을 제시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많이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현재의 평가방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성헌(자연환경공학3): 제도적인 수정과 더불어 앞서 논의했던 '시민의 참여' 또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대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생인 만큼 어떤 보상을 원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다운 열의를 가지고 법안 평가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특정 법안이 진정 '필요'에 의한 것인지, 혹은 '포퓰리즘적 동기' 에 의해 제시된 것인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연아(경영학부 3): 물론 대학생이 사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좋지만 학생들의 활동으로서의 한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이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학교의 동아리만 해도 '중앙동아리'처럼 학교 공식 동아리들은 무려 40년 가까이 유지되는 동아리가 있는 반면 공통 관심사를 갖고 모였다 해도 제대로 조직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한 달도 안되어 흐지부지 되는 모임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이점에서 만약 대학생들이 정치인들의 국정활동을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면 '모니터링단'을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조직원들간의 친밀감도 챙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전용택(융합전자공학 3): SNS 같은 온라인 상의 공간에서 정치와 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페이스북을 하면서 친구들의 담벼락 또는 이런저런 페이지를 보다 보면 유머러스한 이야기의 글들이 대부분이지 정치와 관련된 진중한 사안을 다루는 글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논의와 관련해서 정치인의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입법을 위해서는 정치인의 의정 평가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 위해 SNS를 활용한다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SNS를 논의의 장을 활용한 정치적 논의 장소공간 마련

고성헌(자연환경공학 3): 만약 SNS을 활용한다면 '한양대학교 대나무숲'이라는 페이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양대 대나무숲'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사람들이 고민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보를 하면 페이지 관리자가 제보된 내용들을 선별해서 게시하는 방식이잖아요? 최근에는 '대나무 숲' 페이지가 많이 유명해져서 많은 교내 학생들이 들르기도 하구요.

이 페이지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운영상 '익명성'이 보장되지 때문에 그 동안 혼자 궁금했지만 눈치 보여서 이야기 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정치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개인의 의견들을 익명으로 제보하고, 관리자가 이렇게 제보 받은 내용을 필터링 하는 방식으로 게시함으로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익명성'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직접 이름을 걸고 이야기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개인 대 개인간의 논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오민석(생명과학 4): 또 다른 방안을 제기하자면 저는 대학생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포퓰리즘적 정책 중 하나가 특정 지역에서 표를 얻기 위해 해당지역에 '공항' 등의 경제성 있는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정치인이 먼저 '이러저러한 것이 해주겠다.' 고 이야기 하기 전에 수요자인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정치인의 제안이 단순히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주연아(경영 3) : 국민이 입법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군요. 오늘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나눠보았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바른 의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으로 '의정활동 평가'와 '국민의 의정평가 참여'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의 법안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한 점수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방안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나아가 특정 이해관계에 얽힘이 없는 대학생들이 '모니터링단'과 같은 활동을 통해 법안 평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정평가 참여' 방법으로 미국의 '타운미팅'을 우리나라도 참고하여, 시민이 국회의원의 입법안의 통과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유권자 의식' 향상을 위해 SNS 장을 통한 정보 및 의견 교류의 필요가 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치 수요자인 시민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3차 한양대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⑫ 배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이세현, 박하연, 한지훈, 김범근, 최다은, 유병덕, 한은성 (사진: 김예진)

김예진(바이오·의생명 2) : 지금부터 배재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4 월 24 일 개최한 제 84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를 죽이는 대표적인 정치 형태 중 하나인 '포퓰리즘'을 타파하기 위해 모든 유권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 선진 사회를 이끄는 주역인 대학생들이 유권자로서의 포퓰리즘 개선과 타파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저는 대학생 단체를 통한 활발한 활동, 파급력이 뛰어난 메신저나 SNS 를 통한 메시지 전파 등을 통해 입법 활동의 '심사 위원'이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범근(정치언론 3) : 저는 김예진 학우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리고 칼럼에서도 쓰신 방안 중 하나인 SNS 를 통한 메시지 전파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메신저나 SNS 계정이 주로 개인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현재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범위가 확산되어 개인이 작성하는 의견 하나 하나의 영향력이 강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크고 작은 기업들이 홍보용 마케팅 전략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설문과 이벤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SNS 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소신껏 의견을 작성하고 때로는 의견 대립으로 열띤 토론도 진행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SNS 를 통해 포퓰리즘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파한다면 이는 매우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생 단체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한다.

최다운(미디어 1) : 저는 대학생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매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는 '선진화 연구모임'은 지금 김예진 학우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선진화포럼 홍보대사'로 인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단체로 인해 그 안에 또 하나의 대학생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싶어 하는 대학생들이 많아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거나 토론을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대학생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대학생 단체들이 늘어난다면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유권자로서 그들의 생각을 말하고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예진(바이오·의생명 2) : 대학생 단체 확산, SNS 를 통한 메시지 전파 등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단순한 의사소통의 장에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람들의 참여도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확장된 SNS 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대학생 단체가 만들어져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방법 외에 경제를 죽이는 포퓰리즘적 정치 형태를 타파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하연(간호 2) : 포퓰리즘 타파에 관한 슬로건을 내건 공모전을 기획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학생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외활동과 공모전입니다. 특히 최근 취업에 있어 자신만의 특색 있는 이력을 제시하기 위해 공모전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공모전의 규모와 종류 또한 크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를 죽이는 포퓰리즘적 정치를 주제로 한 공모전들을 만들어 대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더 나아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경제를 살리는 정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현(원예조경 2) :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많은 공모전들이 어느 한 형태로 치우치지 않고 UCC 나 표어, 세미 논문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라도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 년, 한국대학생포럼에서 주최한 포퓰리즘 반대 표어 및 칼럼 공모전이 그 사례가 될 수 있죠.

초·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과학의 날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시죠? 이처럼 포퓰리즘 타파를 위한 아이디어 모집 기간을 정해 여러 관련 단체들에서 공모전을 시행하는 유행,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많은 대학생들에게 포퓰리즘 반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병덕(경영 4) : 저는 캠퍼스 내에서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NS 를 통한 메시지 전파 활동도 좋지만 이는 온라인상으로 그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 효과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진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캠퍼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유권자로서의 캠페인을 만들면 SNS 활동에 비해 속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직접적인 체감효과와 인식 개선을 효과적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의 도리인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지훈(영어영문 3) : 위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에 동의하지만 저는 먼저 유권자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기본 도리, 여러분도 모두 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선거'입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유세활동을 벌이고 각 지역에 투표소를 마련하는 등 실제 선거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

선거에만 열의를 보이지 말고 진짜 선거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이 되자는 의견들로 6 월 4 일 지방 선거 참여가 여느 때보다 독려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은 포퓰리즘적 정치 형태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포퓰리즘 타파를 위해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강력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현(원예조경 2) : ‘유권자로서의 도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후에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나중에 꼭 당선된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한편으로 그 이후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이 끝나면 사후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선거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무턱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선동 글을 올리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관련 홈페이지에 논리적인 글을 싣는 등의 모습으로 정치인들이 그 결과까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예진(바이오·의생명 2)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죽이는 정치의 대표 사례인 포퓰리즘적 정치 형태를 타파하기 위해 대학생으로서, 또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앞서 나왔던 SNS 를 활용한 관련 메시지 확산, 대학생 단체를 만들어 자발적인 소통의 장 형성과 같은 방안에 포퓰리즘 타파에 관한 공모전 개최,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 등의 의견이 더해졌고 더 나아가 선거 독려 및 참여, 꾸준한 관심 가지기와 같은 유권자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공모전 개최'가 대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선진사회를 일구어 나갈 대학생으로서, 또 우리나라 사회를 구성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유권자로서 현명한 행동을 하여 경제를 죽이는 정치를 지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⑬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우한즙, 황정규, 원준희, 최우석, 김유라, 구미연

김유라(심리학과 4) : 지금부터 제 3 차 '강원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 월 24 일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에서 개최한 제 84 차 '경제를 살리는 정치, 경제를 죽이는 정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인 성향이 경제를 죽이는 정치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치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분별하여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지적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를 죽이는 정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의정부에는 몇 년 전, '경전철'이라는 새로운 대중교통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의정부의 도시 전체를 빠르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여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경전철 공사를 진행 하는 중, 그것이 무너져 버려서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사고를 당해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지 한 시의원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포퓰리즘적인 정치타파를 하고 올바른 투표를 하자

황정규(경제학과 4) : 현재 문제점은 우리나라 정부 국회들이 법을 만드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떠한 법이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법이 이렇게 쓰이지도 않는 일명 '장롱 법'이 되어 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연(정보통계학과 4) : 선거에서의 승리가 사회전체의 패배로 이어진다는 점이 포퓰리즘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그리스의 예를 들면, 사회가 감당해낼 수 없는 수준의 무리한 복지정책을 펼쳐서 국가신용을 부도로 내몰았습니다. 푸는 것은 쉬워도 잠그는 것이 어려운 것이 복지정책입니다.

당장 당선되는 것에 눈이 멀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좌파 정당들의 실책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짐으로 되돌아 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계속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한준(경영학과 4) : 포퓰리즘이라는것 자체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이 사람들의 응집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광우병에 대한 문제가 터졌을 때 정부가 '소고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 근본적인 점을 비판해야 하는데 촛불집회에 나온 대부분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왜 시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누군가를 따라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의 비난적인 자세가 아닌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적인 부분에서의 비판으로,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근본적인 부분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겉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은 '죽일 놈의 정부'라고 말은 하지만 6 월 4 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이익만을 앞둔 시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정규(경제학과 4) : 저는 포퓰리즘이 단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정부만능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복지문제 등 모든 것을 정부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재난 사태나 복지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국민이어야 합니다.

공무원문제, 정부가 모든 것이든 해준다는 그런 맹신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민들을 위한 더 좋은 복지를 만드는 것이 아닌 어떡하면 해고당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이 나라의 문제점을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합니다. 때문에 국민, 공무원 그리고 정치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것에서부터 마찰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세금을 늘리는 것을 국민들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안전에 대한 비용이나 복지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선진화된 의식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것은 요금이 오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세월호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마냥 정부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한준(경영학과 4) : 이에 대한 저의 반론이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이 복지를 더 늘린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정치계와 국민계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정치가 코미디언과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미디언인 한 사람이 정치계로 나갔는데 지지율이 70%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을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잘못 따라갔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라(심리학과 4) : 선진국의 좋은 예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비판적인 수용이 아닌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도 외국의 많은 좋은 사례들을 봐왔고 정치계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지 않고 계속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이어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우석(경영학과 4) :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추구하려면 이에 따라 경제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한 문제는 빈부격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잡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6 월 4 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실효성 없는 표퓰리즘적인 정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은 3 단계 밖에 되지 않는 간소화된 단계를 갖고 있어서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법이 재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를 죽이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라(심리학과 4) : 다들 포퓰리즘에 관한 문제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황새가 뱁새 따라간다'라는 식의 정치를 펼쳐 부도가 난 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인 정치를 줄이기 위해서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와 입법 등 모두 국민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하고 생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성립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연(정보통계학과 4) : 메니페스토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메니페스토란 후보자의 정치를 수량화 시켜서 후보자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 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아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매년 메니페스토 공약 집을 출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100 만부나 팔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선거에 참여한 국민들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영국 국민들이 돈을 주면서까지 스스로 이런 것을 사는 것 자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SNS 를 통해 정보를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올바른 정보이든 유언비어이든 무비판적인 수용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영국에서는 주요 정당의 메니페스토가 발표되는 날이면 주가가 출렁입니다. 공약 집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도가 주가까지 흔드는 것입니다.

김유라(심리학과 4) : 메니페스토라는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10 년이 다 돼가도록 이미 있는 정책을 저희가 모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발표는 했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혹은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그렇게 실패로 돌아왔을까요?

구미연(정보통계학과 4) : 국민의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전환이 가장 어려운 만큼 지금 저희도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메니페스토'라는 이름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처음 공익광고를 통해 알려졌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가 영어권 나라냐며 쉬운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하셨습니다. 광고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잘 남도록 이름을 정해야 하고 그런 이름에서 우리는 정서적 반응으로 인해 좀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황정규(경제학과 4) : 무분별한 법안의 발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페이고 법안의 빠른 통과가 요구됩니다. 페이고란 'pay as you go'로 '벌어 들인 만큼 쓴다'라는 말로써 새 국책사업을 벌이려면 그만큼 다른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해 놓고(pay) 하라(go)란 뜻입니다.

이에 무분별하고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도 현재 정부에서 대대적인 정책 중 하나로 내놓은 법안이지만,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이렇게 유용한 법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한준(경영학과 4) : 물론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지역감정이 있기 때문에, 메니페스토가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만 보아도, 그 사람의 유능함과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전 생각이 나서라는 이유로 그 후보를 뽑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 점이 될 수는 있지만 실용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프랑스 대입시험처럼 서술형의 문제를 하나 내고 풀도록 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보고 풀어라 라는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지 대입시험에만 나올 법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가져야 할 하나의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대입시험에 정치, 철학 그리고 윤리 등 시민의식을 바꿀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하나씩 출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목의 도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정치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이에 따른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많은 기업들이 CSR 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입장에서 1 석 2 조의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은 면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행동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진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규제가 아닌 전통시장의 자생능력을 키워야 한다

황정규(경제학과 4) : 이러한 것에 대한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날짜를 제한하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본다면 대형마트의 영업을 못하게 해서 전통시장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이 잘 구비되어있는 대형마트, 바쁜 시간에 틈을 내어서할 수 있는 온라인 구입 등을 통해 대형마트를 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업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봉평장 프로젝트'입니다.

이 기업은 각 가게마다 상인들의 얼굴을 특징으로 해서 미니 간판과 명함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봉평의 유명한 메밀과 봉평 쭈꾸미, 봉평 보쌈 등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카드 사장과 SNS 인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 사장님이 매일 봉평을 다녀오는 것을 온라인에 게시합니다.

봉평시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메밀을 홍보하기 위해 현대카드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통시장의 자립성을 키워줘야지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 속초도 최근에 전통시장이 살아났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이마트가 들어왔을 때 시민들의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속초의 닭강정 등을 통해서 자생적인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속초 시민이 6 만인데, 주말에는 인구가 30 만이 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 내에서 특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준희(의생명소재공학과 5) : 제가 과가 공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황우석 사태, 암이 다 나을 것이라는 거짓말, 집안일을 알아서 해준다는 로봇 그리고 한국이 세계 항공 우주 여행의 주역이 된다는 혹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하는 과학자들은 단지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적을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과 청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객관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미디어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해석을 하는 포퓰리즘적인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두어서 자문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 3 자의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한국의 미디어 특성은 특종과 속보를 원하는 식의 미디어입니다. 무조건 특종만을 위해 '보여주기'식의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얼마 전 맨하튼에서 실제로 한 아파트가 폭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파트폭발의 소식을 국민들은 1 시간 36 분 뒤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사고의 해결을 위해서 늦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미 낸 언론 기사들의 사후관리를 통해서 헛된 조장이나 포퓰리즘에 치우치지 않는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계속 기사를 책임지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비상임 객원 기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내용을 좀 더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미디어의 힘이 단지 과시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이뤄진다면 더 투명한 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석(경영학과 4) : 저는 크게 해결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 측면입니다. 현재 입법 간소화로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은 3 단계를 거칩니다.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시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규제와 심사를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감시 기구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 판단 능력이 있는 자국민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서명을 받아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쓸데없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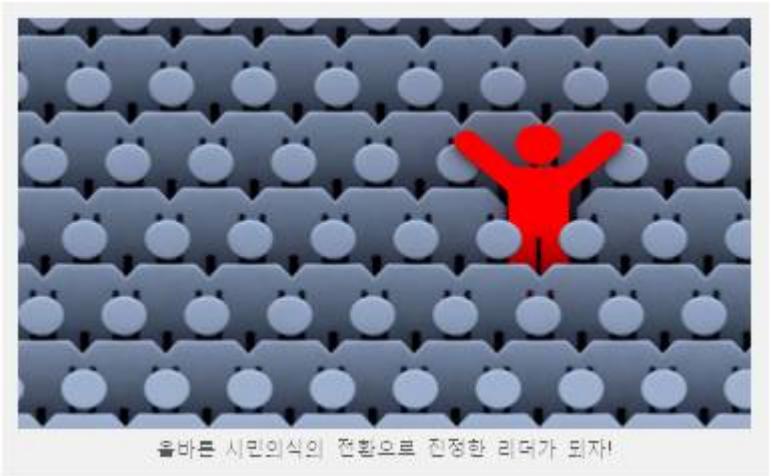
현재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술렁이는 글로벌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시설이나 쌀과 같은 것들의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입장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의식적인 측면입니다. '나 하나 쯤이야' 라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해야지'라는 자율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인들의 학습법을 따라 토론문화를 정착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서관에 가면 각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책 하나를 놓고 그것으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젠가로 공동체의식을 기르고 식물 키우기와 같은 것으로 사소한 것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과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선거에 당선이 된 의원이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나라 발전에 이바지를 하게 되면 국민과의 신뢰 형성이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세율을 증세한다고 할 때, 프랑스의 1 인당 GDP 는 43.6%인데 국민들은 이것을 믿고 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면에 1 인당 GDP 가 28.7%입니다. 이것 자체도 안 내고 거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의식에 있습니다. 의원이 당선이 되면 그들이 나라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호적인 신뢰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라(심리학과 4) : 생각보다 포퓰리즘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포퓰리즘과 예상치도 못하게 항상 정확할 것 같던 뉴스와 같은 미디어 또한 포퓰리즘에 젖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미 있는 '메니페스토', '페이고'와 같은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구축하는 것과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제도들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자율적인 의식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입법할 시의 국민들의 참가와 유태인의 토론식 학습법을 도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도 또한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적 공헌을 중요시하는 시대에서 단지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립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보상과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시간의 유희를 위해서 미래의 귀중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생각을 한 나라를 대표하고 보좌할 수 있는 의원들이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⑭ 군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기존 참여 연구모임원들이 진행한 자체 군산대학교 연구모임

김현경(해양 4) : 지금부터 군산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4 월 24 일 개최한 제 84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월례토론회에서 언급되었던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김기천 논설위원의 말에 적극 동의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일련 과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 중 프랑스의 선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부진의 성장매개체는 국민신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연구모임을 통해 프랑스 국민들의 정치적 신뢰가 형성된 원인을 시작으로 어떠한 방법들이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연구모임은 추후 전북 대학생 연합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실제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을 알려드리며,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선화(간호 4) : 저는 실천방안을 모색한다는 다음의 연구모임에 조금 더 쉬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어떻게 프랑스는 국민신뢰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1 인당 GDP 가 약 43,000 달러로 우리나라 2 배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현재 정치·경제 동향은 한때 주춤했던 경제 성장률을 딛고 일어나 2014 년 성장하는 기세에 있습니다. 외채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는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별산업조사팀)

국민들이 생활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개선 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과정을 보면서 더욱 믿게 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서아름(경영 4) :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변화되는 것을 체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신뢰라는 것을 투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배고픈 이에게 화려한 수라상은 아니더라도 요깃거리를 챙겨준다면 먼저 안정이 되고 밥상을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프랑스는 2012 년에 역대 최고치로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소득수지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활동으로 국민들의 자연적인 신뢰는 당연하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경(해양 4) : 네, 김선화 학우와 서아름 학우는 국민들의 신뢰는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정치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동의해주시며, 현재 프랑스의 경제활동을 실제 국민들과 연계되는 부분에서 수치화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자료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십시오.

박진경(해양건설 4) : 저는 국가가 경제활동을 발전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국민의 신뢰가 형성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국민 개인에게 공급이 되며, 융통성 있는 투자와 소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돌아가게 하느냐가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상승곡선을 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소비·투자 등 내수 침체와 이에 따른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2013 년에는 0.8%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청년실업률만 본다면 25%로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경제 정치에 대해 신뢰를 하는 것은 분명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가능성은 국가가 얼마큼 효율적으로 국고 운영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 국가 발전이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2017 년의 다음 대선까지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는 부가적으로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정자연(사학 4) :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당장 눈앞에 성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진경학우의 말에 일부분 동의하면서도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이 신뢰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침체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다른 부분에서 믿음과 신뢰감을 주면서 다음을 기대하고 기약하는 것이 올바른 신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경(해양 4) : 두 분 다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일 때에도 정치의 행태가 얼마만큼 올바르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덧붙여 의견제시를 계속해 주십시오.

문성현(영어 4) : 네, 오늘 주제가 프랑스의 선진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정치적 신뢰감을 형성했느냐가 주 관건이라지만, 돌려서 생각해 본다면 프랑스의 경제 정치는 어떻게 집권을 했길래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저는 위의 네 학우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을 종합하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한 바 프랑스의 선거는 일요일에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80%이상으로 높은 선거율을 보이며, 선거 기간에는 10 대, 20 대의 대화주제가 선거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참여를 보이는 것 자체가 무의식 속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신뢰감과 실망감을 통해 전체적으로 정치신뢰도를 쌓아가는 신용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참여정치로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선례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영(영어 4) : 요즘 우리나라도 젊은 층이 선거와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프랑스처럼 선진 경제 정치로 가는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방영하는 무한도전을 애청하는데요. 요즘 무한도전에서 앞으로 10 년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층도 선거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TV 매체와 미디어가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홍보하면서 젊은 층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층 더 나아가 진짜 정치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에 밀접한 매체로 자리잡는다면 국민들도 한 층 더 쉽게 다가가면서 정치에 관여하며 신뢰도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현경(해양 4) : 문성현 학우와 노미영 학우의 의견은 젊은 층의 정치적 참여가 훗날 미래를 이끄는 정치적 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만큼 우리 군산대 선진화 연구모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새삼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는 곧, 학우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살려놓은 경제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듯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꾸준한 정치 모니터링을 통하여서 신뢰도를 형성하여 경제가 사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며, 연구모임원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⑮ 공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박수경, 심성보, 김현기, 구혜승, 양연모

심성보(공주대 화공 2): 이제 3 차 공주대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메일로 초청장과 토론문을 보내드렸듯이 지난 4 월 24 일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포퓰리즘적 의원입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포퓰리즘적 의원입법이 경제를 죽인 대표적인 사례 제시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하였습니다. 여러 해결 방안 중에서 오늘 연구모임 시간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학생 단체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학생들은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며 오늘날의 입법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날의 포퓰리즘적 의원입법을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관심하게 있는 행동은 더욱 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막상 정치에 참여하려면 방법도 모르고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 바로 대학생 단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하신 분 있나요?

김현기(공주대 화공 4):저는 특정한 사례가 각 정당의 대학생 위원회를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정당으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당이 있는데 두 정당 모두 대학생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새정지민주연합당의 대학생위원회 소개글을 인용하자면 "20 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 학생들의 힘으로 정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당내 조직이고 각종 청년 정책 연구 등 대학생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수경(공주대 화공 4):저는 청춘의 지성을 찾아보았습니다. 청춘의 지성은 스펙 쌓기, 취업에만 올인하는 대학 풍토가 마음에 안 드는 한 성격하는 20 대들이 있는 신개념 대안대학으로 다들 한가한 주제라고 여기는 '공동체', '정의', '진보', '나눔' 등에 대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은 개념 있는 20 대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끼(연극), 다락(예술), 쏘메(정치, 사회), 역동(역사), 더숲(봉사) 등의 동아리 연합이며 저는 sns 를 통해 잘못된 사회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을 올리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대의 목소리를 외치는 청춘의 지원

구예슬(공주대 화공 4): 저는 현재 심성보 학우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선진화포럼 홍보대사 활동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이 기자단, 해외봉사활동, 서포터즈였는데 심성보 학우가 하고 있는 활동은 다른 활동들과 다르게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 대해 활동을 해서 독특한 대외활동으로 생각했습니다.

양인모(공주대 화공 3): 사례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이 정치 관련된 대학생 단체의 수가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가 아닌 대학생 단체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각 대학의 동아리의 연합을 생각했습니다. 특정인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동아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심성보(공주대 화공 2): 저도 현존하는 대학교 동아리를 연합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합을 했을 경우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면 철저한 조직 체계와 활동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단체가 생겼을 경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예슬(공주대 화공 4):저는 대학생 단체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이슈를 캠퍼스 내에서 대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치적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기에 바쁘고 자신의 의견을 정부에서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불신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학생들이 정치적 이슈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만화나 글을 통해 알려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포퓰리즘적 선거 공약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공주대 화공 4):제 생각으로는 포퓰리즘적 의원입법을 막기 위해서 대학생 단체가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의정모니터를 해서 대학생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알려진다면 관심이 없던 대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sns 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간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집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공주대 화공 4): 물론 평상시에 정치적 이슈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처럼 6.4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 며칠 전부터 대학생들에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정치 참여의 기본이 되는 선거부터 대학생들이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인모(공주대 화공 3):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 매 달 발행하는 소식지처럼 간단하게 정기 간행물을 만들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알리는 것과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성보(공주대 화공 2) : 오늘은 정치 관련된 대학생 활동 단체의 사례로서 '공동체','정의','진보','나눔' 등의 대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은 개념 있는 20 대들의 모임인 청춘의 지성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힘을 쓰고 있는 한국선진화포럼 홍보대사 활동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 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 학생들의 힘으로 정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당내 조직인 각 정당에서 운영하는 대학생위원회에 대해 들었으며 현존하는 대학교 내에 동아리를 연합해서 대학생 단체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학생 단체의 활동으로서 정치적 이슈를 대학생들에게 만화나 간단한 글을 통해 알림으로써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과 대학생들이 마음 편히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대학생 단체의 활동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져야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높일 것이고 정치에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의원입법 포퓰리즘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대학생들이 밝은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6.4 지방선거처럼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생의 선거 참여 유도와 함께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선거 참여율도 증가시키고 포퓰리적 공약을 가려내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든 대외활동의 필수가 되고 있는 sns 와 블로그 등의 온라인 활동과 매달 정기적으로 간단한 소식지를 발행해서 대학생 단체의 사회적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정치 참여에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자료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것과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출처-
1.http://www.vop.co.kr/A00000665384.html

⑯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한범희, 전미래, 장윤석, 최무성, 황단비

장윤석 (원광대 신방 4) : 지금부터 원광대학교 3 차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차 연구모임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84 차 월례토론회에서 나온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의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표를 얻기 위한 정책들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규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4 차 월례 토론회에서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옥남 바른 시민사회 정치 실장은 다양한 규제입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 대학원 특임교수는 포퓰리즘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올바른 선출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올바른 선출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3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경제에 대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폭넓은 안목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패널분들이 어떻게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출을 할 수 있을지 대학생이 생각하는 올바른 선출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래 (원광대 신방 3) : 저는 올바른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나머지 선거 때마다 낮은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날은 쉬는날, 노는날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무관심에 대한 해결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정치교육 해주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경제교육도 시켜준다면 올바른 리더를 선출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황단비 (원광대 행정 3) : 맞습니다. 저도 대학생의 정치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미래 학우의 국가적 측면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만드는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정치를 딱딱하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준다면 정치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총학생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일을 하는것도 작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회장을 선출하려면 재학중인 학우들의 표를 얻어야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학생회장 후보들은 학우들에게 공약을 겁니다. 학우들은 지켜질 수 있는지, 실행시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웠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는 학우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집니다. 대학생들이 정치를 생각할 때 멀게 느끼지 말고 학생회의 공약을 검토하는 것처럼 가까이 느끼고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석 (원광대 신방 4) : 두 학우는 올바른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해주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정치 참여,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밖에 올바른 선출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저번 2 차 연구모임에서도 언급한 미디어를 통한 정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범희 (원광대 신방 4) : 저도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 참여에 공감합니다. 현재 사회는 미디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를 미디어에 접목시킨다면 큰 시너지 효과와 함께 선거때 후보자 선출 시 올바른 리더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최무성 (원광대 신방 4) :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는 현재 미디어에 녹아 있고, 올바른 정치보다는 올바르지 못한 정치기사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면을 먼저 고치지 못한다면 미디어를 통한 정치는 올바르게 흘러가지 않을 것 입니다.

한범희 (원광대 신방 4) :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SNS 를 통한 정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SNS 는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의 압력도 없고 자신이 갖고 있는 소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후보자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올바른 선출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블로그 등에 포스팅을 함으로써 더 많은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무성 (원광대 신방 4) : SNS 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그러한 면에서는 공감이 갑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사용자가 많은 포털사이트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보다는 중립적이고 올바른 정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선출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편파적인 정치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편파적인 기사를 염두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정치기사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편파적인 기사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게시판을 통해 잘못된 점을 언급해야 할 것 입니다.

장윤석 (원광대 신방 4) : 한범희 학우는 SNS 를 통해 자유롭게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올바른 선출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었고 최무성 학우는 사용자가 많은 포털사이트에서의 올바른 정치 정보 제공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패널분의 생각이 있으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른 리더의 선출,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

전미래 (원광대 신방 3) : 아까 황단비 학우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에서 생각이 났는데, 의원 입법활동 감시를 대학생들이 나서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현장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의원 입법활동 감시를 한다면 어떤 연령층보다 빠르게 소식을 접하고 전파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올바른 선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선 정치 사이트 노출의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배너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석 (원광대 신방 4) : 전미래 학우는 대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원 입법활동 감시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학우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3 차 연구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선출로 후회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화 과제 2:

경제민주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제 65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권혁규(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선진화포럼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본 재미있는 이야기로 글을 시작할까 합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문법을 강의하면서 단어가 '부정+부정'으로 구성될 경우, 그 뜻이 긍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가령 '안 할 수 없었다'가 그런 경우겠죠.

'안 하다'와 '없다'의 부정+부정이 결국 '했다'는 긍정의 뜻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긍정'의 단어는 결코 부정의 뜻이 될 수 없다고 교수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잘도 그러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를 들으면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경제', 그리고 피와 죽음으로 맞바꾼 '민주화'의의미가 합쳐진 긍정의 의미입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신분과 계급의 차이,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정책은 이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책은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타당하면서도 적절하여야 하며 일관성 있고 명확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과 미래의 편익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악한 결과를 낳는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그리던 유토피아가 도래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만일 모두가 동의하는 시대적 요구라면 더 이상 모호한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더 크다면, 천국에서나 실현 가능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면, 이 영혼 없는 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시간낭비겠죠.

최근 국내 보수 및 진보 정당들이 함께 부르짖고 있는 헌법 119 조 2 항 경제민주화의 중심에는 1 대 99 로 상징되는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고, 심각한 양극화는 한국 경제의 독버섯인 재벌의 독점, 독식, 독주 탓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이 동네 빵 가게와 피자, 치킨 가게까지 영역을 넓혀 자신의 배만 불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벌이라는 거대한 공룡을 제거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고 시장 역시 정부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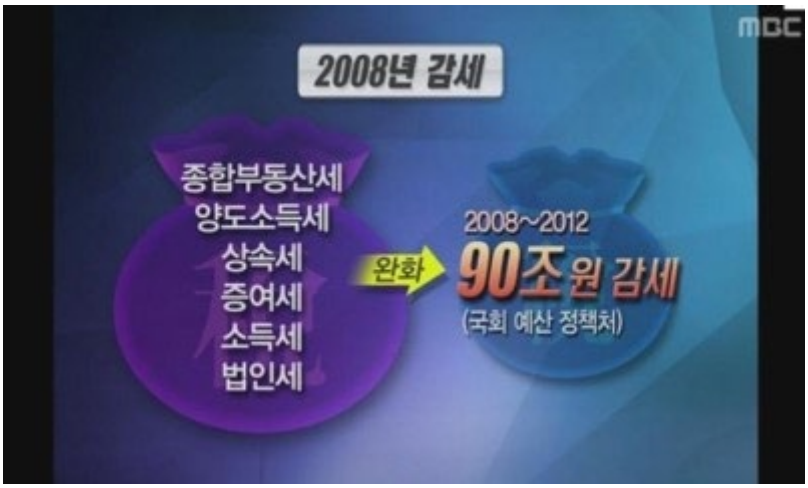
하지만 양극화의 원인을 모두 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의 불행은 저들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식의 편가르기는 저급한 정치 기술일 뿐,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치유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반 시장, 반 기업의 정서는 대부분이 오해 내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을 위한 보호정책이 바로 탁상공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빵집 골목상권 잠식 논란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들은 동네 제과점의 영업을 방해하지도, 고가 경품 공세로 소비자를 유혹한 적도 없습니다.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우리 소비자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역시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그 극명한 차이를 좁힐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부족을 대형마트 탓이라며 영업규제를 강행한 결과가 어떠한가요? 대형마트의 휴무 전날 오히려 줄이 길게 늘어섰을 뿐입니다. '중소기업 업종 보호'라며 대기업 진출을 막아온 면도기 시장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직 도루코 면도기를 사용하시나요?

조세정의와 복지국가 주장의 논리도 상당 부분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유권자 표를 얻는데 재미를 본 '무상 시리즈'를 이어 가고 그 곳에 필요한 재원은 기업에게서, 세율을 높여서 마련하겠다는 발상인데요. 세율과 세수는 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더욱이 한국선진화포럼 5 월 월례토론회에서 김정호 박사가 주장했듯이, 현재 소득 상위 20%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의 90%를 넘는 수준이며 상위 1%의 법인은 법인세의 8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세 정책 또한 소위 '부자감세'라며 부자들에게만 특혜를 준 것 같지만 모든 계층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지요. 기대만큼 낙수효과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소니를 제치고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서 주인공으로 등극한 데에는 바로 그들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 신제품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는 아닐까요?

소득 평준화, 공정에 대한 갈증은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공정이란 경제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이라 할 수 있지요.

따라서 현재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어떠한 정책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날이 5 년뿐인 정치인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요.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매번 거짓말을 일삼았고, 또 그것을 시도하였고, 정치적 구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지요.

만일 경제민주화 실현이 가능하다면 25 년 전에 이미 헌법에 포함된 경제민주화를 지금에 와서 새로운 정책인양 다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 아닌가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이에게 벌을 주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가장 공정한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은 바로 잘하는 이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 평등의 재분배 정책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땀을 흘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는 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똑똑한 소비자가 기업의 변화를 가져왔듯이 현명한 유권자만이 더 나은 내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달력도 앞으로의 5 년에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② 김승현(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오늘날 우리의 삶은 경제논리에 따라 자본, 상품, 시장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순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죠. 1990년대 초, 미국은 공산주의 체제의 중심이었던 소련과의 오랜 냉전 끝에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뒤 20년 넘게 자본주의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이후 미 군정에 의해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최전선에서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해 발전시켜 왔죠.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개방된 금융시장과 무역시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역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시장개방과 수출을 강조하는 이 같은 경제 정책은 천연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분단국가를 세계 10대 무역강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 약 5000만 명의 인구와 1인당 연소득 2만 달러라는 두 가지 핵심 지표를 갖추며 세계 주요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지속적 성장을 통한 국민 소득의 증가는 '부의 성장'에서 '부의 분배'로의 프레임 전환을 가져왔으며 그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 '경제민주화'라는 쟁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란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빈부격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소득격차로 인한 소비수준의 차이에서 삶의 질도 각자 달라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노동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합니다. 부의 집중과 경제적 상류층의 형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경제민주화와 소득분배라는 개념과는 잘 부합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부의 축적을 최고 목표로 삼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득을 분배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무척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체제의 특성, 구조와는 맞물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생태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체제와 개념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는 그러한 변화의 요구를 거세게 마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 이승훈 명예교수는 "민주화는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이 정치사회적 의사 결정권을 독점하는

체제를 깨고 국민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변화다. 그런데 시장의 자원 배분은 국민 모두가 1인 1표의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경제영역이 민주화라는 단어와 접목될 수 있는 영역인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현재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정략적,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시각인데요.

이 같은 관점에선 소득분배의 악화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모든 자본주의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사회만의 문제점으로 바라볼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정책적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리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오히려 세계 무대에서 국내 글로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이 같은 시각의 주요 주장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1987년 정치민주화 이후 '성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경제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는 주장인데요. 5년마다 바뀌는 정권과 달리, 수십 년째 바뀌지 않는 재벌 체제에 교체와 분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마불사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방법으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는 유독 기업 CEO들에게 관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성되고 있는 기업소유구조, 노동유연화를 핑계로 행해지는 노동자들의 권리침탈 등의 폭넓은 부분에 대한 전반적 개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분된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점은 좁혀지지 않고 수평선을 그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정운찬 전 총리의 중재 역할을 기대했는데요. 대기업들의 불참과 당초 기획과 다른 행정부의 부족한 지원으로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위원장이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고민이자 과제이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대안을 찾기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초적인 갈등의 원인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와 상호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강대 박호성 교수는 자유와 자유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적 부르주아 계급의 신념체계이며

행동강령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자유주의는 봉건적 특권계급의 전횡에 대항하여 떠오르는 시민계급의 저항 이념이었고 강제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자유와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 행동에 기반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에 대응하는 것들에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주의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시민운동으로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의회에 의한 입법 절차가 형성되고 개인의 기본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구조를 형성하며 영국에서도 휘그당에 의해 입헌군주국 형태의 유사한 국가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자본주의의 팽창이 본격화 되었고 세계시장이 서서히 형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유주의에 의한 자본주의의 급진적인 발달은 노동자 계급의 형성과 연대를 동반하였으며 불합리한 처우와 노동 여건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불만은 노동운동을 형성시켰습니다. 이는 사회주의의 형태를 갖춘 자유주의적 형태의 노동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848년 전 유럽에서의 혁명을 불러왔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자유'의 억압에 대한 '평등'의 본격적인 반발의 시작을 의미하였고 자유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엄중한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또는 자유와 평등 간에는 갈등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오늘날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들과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차이는 갑작스럽게 한국 사회에서 대두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오랜 시간 지속되어왔던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이 같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상호 연관성이 높으면서도 모순적인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인 토크빌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단 한 단어, 즉 평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 속에서의 평등을 원한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가난과 예속 속에서의 평등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유 속에서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유사하면서도 대립적인 개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민주주의적 평등과 분배의 개념이 100% 적용되는 것은 동일한 논리상 갈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일시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대한민국 선진화에 충분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계화 체제 속 신 자유주의 경제논리 속에서 시장을 넓게 바라본다면 오늘날 쟁점화되는 동반성장 정책처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행동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기업들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념 논리에 휩싸여 정치 공방의 재료로 악용되는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선진화의 커다란 장애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③ 김신우(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약 2 달 전부터 대형마트 및 SSM 은 매달 2 주차, 4 주차 일요일에 강제 휴무해야 한다는 규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 및 SSM 이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의 밥그릇을 빼앗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이 같은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제가 중소기업, 영세 상인, 재래시장에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최근 재래시장의 한 영세 상인이 “주말에주변 대형마트 및 SSM 이 휴무했지만 찾아오는 손님 수는 그리 늘어나지 않았다.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인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규제 시행 후 오히려 소비자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대형마트 및 SSM 에 몰렸으며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상 밖의 현상이 일어나자 하나 둘씩이 규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규제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노렸지만 오히려 소득 양극화는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편과 불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즉, 재벌을 규제한다고 해서 소득 양극화는 그리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 언론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민주화의 키워드는 바로 '상생'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 상인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야말로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죠.

재벌정책 비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경제력 집중 완화	없음	• 출총제 재도입 • 순환출자 금지 • 지주회사 규제 강화 • 금산분리 강화	• 출총제 재도입 • 순환출자 금지 • 금산분리 강화 및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불공정행위 규제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 •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담합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 공공부문 중소기업 보호 강화	• 공정거래위 독립성 강화 • 초과이익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대기업 주주일가와 임원의 법률위반 엄정 제재 • 기업윤리헌장 제정 의무화 • 사회적 책임경영 국제표준 ISO 26000 적극 수용	• 기업범죄의 유전 무죄 풍토 쇄신 • 사회적 책임공시제도 도입 • 대주주 전횡 방지 및 소수주주 보호방안 마련	•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시 대주주이사 자격 제한 • 연기금 주주권 행사 • 노동자 경영참여

그리고 경제민주화 구현을 위해서 몇몇 사람들은 '재벌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및 SSM 규제정책 시행에서도 알 수 있었다시피 무조건적인 재벌 규제가 소득 양극화를 해결해 줄지는 의문이 드는데요.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해 한 정당이 내세운 정책을 살펴보죠.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인데요. 순환출자란, A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계열사끼리 출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계열사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출자총액제한은 이러한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어느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의 부활에 대한 전문가의 찬성 의견 및 반대 의견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찬성하는 의견
1) 대부분 영세 상인들의 돈줄인 외식업 및 제과업(떡볶이, 빵 등)까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2) 경제민주화의 근본은 상생이다. 상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은 필수이다. 고로 상생과 발전을 위해 출자총액제도의 부활은 필요하다.
3)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권력은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을 막아 독점을 막아야 한다.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의견
1) 전 세계가 경제불황인 상태에서 재벌규제는 국가의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2) 재벌을 규제한다면 국내에 있는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힘들며 결국 이는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 진출을 기피할 것이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은 실효성이 없다. 우리나라의 출총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도입-완화-폐지'라는 패턴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즉, 출총제 부활은 동반성장에 대해 그리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출총제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출총제 반대 의견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형마트 및 SSM 규제정책처럼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세계경제는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경제대국인 미국도 휘청거리고 있으며 여러 기관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 세계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총제를 통한 재벌규제정책이 시행된다면 경제성장의 둔화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출총제를 도입한다면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의 기피를 가져올 것이며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외국으로 무수하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외국으로 나간 국내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제상황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외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우리나라 경제가 출총제 도입으로 더욱더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점은 재벌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합, 일감 몰아주기, 하청업체 사찰 등과 같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반드시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가 강화되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확실히 근절해야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인재, 기술력, 자본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 그림을 보시다시피 중소기업이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이지만 왜 다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가길 희망하는 것일까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줍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하면 중소기업에 비해 월등히 좋은 복리후생이 보장됩니다.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너도 나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을 외치고 있으니 중소기업이 탄탄해지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취업 준비하세요!"라고 등 떠밀 수는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중소기업을 택할 수 있게 중소기업만의 강점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중소기업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게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이점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면 남성, 여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이죠. 또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지닌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 시설을 확충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있어서 '친재벌이냐? 재벌 응징이냐?'라는 아주 획일화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글들로만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균형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를 실현시키자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재벌, 대기업의 개혁이 아닌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윈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의 길이겠죠.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도 다각화된 시각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집합을 찾아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④ 라광수(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최근 양극화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양극화라는 단어는 아주 예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돼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과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고 그것이 양극화와 뿌리 깊게 연관돼 있는 사실 때문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유 역시 양극화로 인한 사회의 분열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 민주화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양극화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 대 80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다양한 개념에 적용되곤 하지만 우리가 다룰 양극화라는 개념과 연관 지어 생각하면 20%의 사람이 80%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혹자는 그보다도 더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현재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30~40 년 전만 해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많은 부를 차지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잘 살지 못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살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느끼는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승하거나 많은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양극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전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착각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양극화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막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누구나 열심히 한다면 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나 저 친구나 모두 다 못 살았고 받는 교육은 공교육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기회가 평등한 편이었습니다.

즉, 노력만으로도 자신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러한 사회를 계층 간 이동성이 크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계층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면 사람들이 크게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는 계층 간 이동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이동성의 심각성은 최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교육을 줄이려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교육 시장은 절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교육을 압도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요즘 중, 고등학생들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에는 잠을 보충하고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교육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교육에 더 매달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집안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부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계층간의 이동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그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극화라는 것이 단순히 교육 시스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현상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이며 갑자기 생겼다기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서서히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단순히 교육적인 면에서 벗어나도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 중 하나가 바로 대기업의 사업 확장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출현으로 동네 슈퍼들이 모두 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거대한 자본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대형마트를 동네 슈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기업만 살아남게 되고 결국 개인 사업자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만 보더라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없어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업 세계에서의 양극화 역시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사실 면밀히 따지자면 기업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라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슈퍼의 개인 사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의 마트를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결코 잘 산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즉, 대기업 자체는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이 커지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양극화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친 사업 확장은 건전한 시장 경쟁의 원리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세계의 대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극화는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의 힌트는 바로 계층 간 이동성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만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형제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안 될 놈은 안 되는" 세상은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 꿈을 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선 우선 교육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하겠지만 위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교육의 평등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진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극화의 뿌리가 이러한 교육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 교육 문제만 해결한다고 성공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경제 민주화를 원하는 그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어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의 장점이 현재의 단점이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끊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더 많은 문제들이 따르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더딘 걸음이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⑤ 유나연(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쉽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곧바로 답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민주주의에 '경제'라는 단어 하나를 붙였을 뿐인데도 그 개념은 참으로 우리에게 모호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알쏭달쏭 한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헌법 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시장의 상벌기능은 유지하면서 사회복지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최근 경제 민주화가 정치권에서 주요 정책으로 거론되며 이 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정당에선 재벌 해체, 즉 그동안 국가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며 급성장한 재벌의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벌의 재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조건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옳은 기능일지 생각해 봅시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여러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라는 큰 틀에서 급격하지 않은 변화를 추구하는 여당과는 다르게 야당은 단기적으로 재벌그룹의 일률적 확대 억제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야당의 생각을 들어보니 저는 얼마 전에 구체적으로 알게 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떠올랐습니다. 2, 3월 신문에서 자주 등장하던 용어로 현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인데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 자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출총제'는 1986년 처음 도입된 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 2009년 폐지되었던 법안인데요. 2011년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의출총제 부활 요구에 이어 야당도 현재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출총제 부활을 주장합니다. 경실련은 "출총제의 재도입 없이는 재벌 개혁을 논할 가치도 없다"고 못박았는데요.

출자총액제한제 연혁

1986년 12월 제도 도입	30대 재벌 계열사는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계열사에 출자 금지
1998년 2월 제도 폐지	
1999년 12월 제도 재도입(시행은 2001년 4월)	30대 재벌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계열사에 출자 금지
2002년 4월 제도 완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재벌로 대상 축소
2003년 12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제도 완화	자산 규모 6조원 이상 재벌로 대상 축소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은 출총제 졸업 혜택 부여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확대
2006년 4월 예외인정 확대, 졸업기준 확대	
2007년 4월 제도 완화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재벌로 대상 축소 출자 한도 순자산의 25%에서 40%로 확대
2007년 7월 제도 완화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 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만 적용
2009년 3월 제도 폐지	
2012년 1월 제도 부활 논의	

반대론의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정위원회 반대론의 논거는 정치권에서 최근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벌의 골목상권 잠식 문제와 출총제의 정책목표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출총제는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총량적으로 막는 데는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의 주력 업종 등 특정 분야 진출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정당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입장

새누리당	· 출총제 부활 부정적 · 공정거래법 강화 등 보완책 마련
민주통합당	· 출총제 부활 · 10대 재벌 대상 순자산의 40%까지 인정
통합진보당	· 출총제 부활 · 10대 재벌 대상 순자산의 25%까지 인정

저는 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한 외국의 여러 법안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클레이톤법(Clayton Act)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제7조는 한 기업에 의한 다른 기업의 주식취득 거래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식이나 기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연방거래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자가 거래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마찬가지로 종사하는 여타의 자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취득행위의 효과가 국가의 특정분야에서의 일정한 거래분야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는 사적 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1947.4.14 제정: 법률 제54호, 2009.6.10 개정: 법률 제51호)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적 독점과 부당한 거래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금지하고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며, 결합, 협정 등의 방법으로인 한 생산, 판매, 가격,기술 등의 부당한 제한 그 외의 대부분의 사업 활동의 부당한 구속을 배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창의를 발휘시켜 사업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또한 고용 및 국민 실소득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각국에서도 경제 민주화는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출총제 만으로 재벌 개혁이 모두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다양한 개혁 정책들도 병행 추진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규제 대상을 상법상 특수관계인 것까지 확대해 재벌 총수의 친인척까지 망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정거래법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지원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시장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3배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확대,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당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엔 각각의 방안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그 실천이 단기적 방향의 포퓰리즘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줄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대기업, 재벌그룹에 대한 반감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재벌에 대해 욕을 하면서도, 막상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서는 대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즉, 대기업의 영향력을 줄이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대의를 위한 길인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을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⑥ 이윤하(경북대학교 경상통상학부)

지난 5 월 24 일 한국선진화포럼에서 '경제민주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게 생소한 주제는 아니지만 각자의 의견이 분분한 예민한 주제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생각해왔던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 민주화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주제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우선 경제 민주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 119 조 ①항과 ②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①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②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다시 말해 경제 민주화는 헌법에 기초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최근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자본주의가 내포한 자본의 축적이라는 속성 때문에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이미 20 세기 초 자본주의가 초래한 양극화 문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전세계는 복지국가의 확대라는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다시 한 번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재벌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비용이 감소해 효율적인 생산을 이끌어 낸다는 말입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 주도 하에 소수의 재벌에게 경제력을 집중시켜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일으킨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등장하게 된 재벌이, 세계에서 가장못살던 나라를 GDP 2 만 달러를 넘어서게 한 원동력이 된 재벌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시대적 상황이 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재벌 기업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파이를 나누기보단 우선 파이의 크기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지금까지 키운 파이를 제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돼 외화보유고가 급증하면서 나라는 갈수록 부강해지는데 국민들의 삶이 고단해져 가는 현실에 그 책임을 재벌에게 묻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막고 경제력을 일반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주의란 국가의 경제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경제를 이룩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이 재벌입니다. 재벌 경영 체제가 가지는 장점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재벌이 나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 체제의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현대자동차의 미국 진출과 성공 등 세계와 경쟁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재벌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 차원을 넘어선, 그 존재만으로 수많은 특혜를 누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재벌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날 재벌 대기업이 이뤄낸 성과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이나 고위급 간부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헌신 위에 이루어진 경제발전의 성과를 재벌이 독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벌들이 비판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있습니다. 기회의 불평등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지고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재벌 기업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재벌 기업이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기업으로 재탄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재벌 기업의 사회적 활동 강화입니다. 요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크게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도 사회적 환원 활동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장학재단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체계적 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비해서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회활동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어디에 무슨 사회 시설을 지었는지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참가하고 있는 삼성의 Dream class 는 사회 문제로 떠오른 높은 등록금 때문에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대학생들에게 일정한 장학금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가정 형편이 불우한 중학생들의 멘토가 되게 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막자는 취지의 사회 공헌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멘토 역할의 대학생들과 멘티 역할의 중학생들에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재벌 기업이 창조적인 사업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애플이 존경받고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할 만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통해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가의 창조적 활동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 중 이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벌 기업은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재벌 기업이 식당 등 자영업에 진출해 영세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것은 자영업자와 중산층의 몰락, 양극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내수에 치중하기보다는 전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 낸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재벌 기업의 존재 이유에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수많은 논의 중에 재벌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재벌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벌과 국민이 대립하는 양상이 아닌, 서로 공생적 시장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혜택이 부여된 토양에서 성장한 재벌 기업이 진정한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를 선도할 수 있는 철학적 논의와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극화 문제를 비롯한 경제 민주화는 한층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⑦ 정다래(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 월 대선을 앞두고각 정당에서는 '경제민주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에게 공정한 소득 분배를 요구하고 중소상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해 살리겠다는 정책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경제민주화 정책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상위 1%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기업의 시장 기능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분배의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자극해 표심에 반영하려는 근시안적 대안과 정책에 대해 유권자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할 것입니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득을 재분배한다고 해결될 문제일까요? 지난달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65 차 월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대한민국만큼 중소기업을 보장하고 재벌, 대기업을 통제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라며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먼저 살피지 않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관련하여 헌법의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119 조 제 1 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나옵니다.



또한 제 2 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이 합쳐지며 혼란이 야기되므로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에 있어서 정치적인 국가의 개입과 시장 기능의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뿐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속한 나라들은 소득의 양극화, 실업 등 보편적인 경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국내의 경제는 곧 세계의 경제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토론회 발제자인 서울대 이승훈 교수는 세계화를 통해 선진국의 노동자는 빈곤해지고 개도국의 노동자는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지만 빈곤을 탈출하면서 세계화는 지구촌의 빈곤을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진국 기업들은 반세계화를 주장하지만 개도국의 근로자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경제민주화가 현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지나친 경제 개입은 시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현 상황을 그대로 시장에 맡겨 둔다면 개선될 수 없는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개념은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되 부당하게 나의 것을 뺏기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개입될 수 있는 국가의 영향력이 특정한 집단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법은 특정집단이 아닌 국민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도모하는 역할을 기본으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특정집단에 치우친 대책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경제문제에 대한 검토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부품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에서 경제와 민주주의 중 어느 하나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공존하는 개념이 완성되어야 하며 한 가지에 치우친 대책과 대안이 아닌 모든 국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기 전에 2030 세대를 아우르는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피는 현명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표면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20 대가 점점 양극화 틀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등록금 문제에서도 단순히 등록금을 반으로 내린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되죠. 사교육 기관에 법으로 특정 액수를 고정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성급한 개입이 눈속임 등록금 감소를 불러왔다고 봅니다.

최근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의에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서민을 위해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개혁', '재벌개혁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두언 의원은 재벌의 규모가 커진 것을 경계하면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벌개혁과 대기업 개혁과 소득분배의 개선은 원인과 결과 문제가 아니며 양극화의 해결 방안도 아닙니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횡포를 막고 시장 경제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기준을 넘어선 개혁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민주화를 재벌 개혁, 대기업 개혁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양극화의 해소라면 실제로 저소득층이 처해있는 실질적인 문제의 구조를 변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복지, 최저임금, 다문화 가정문제, 등록금, 아르바이트 조건, 노인문제처럼 일상생활에서 양극화되고 있는 연령, 인종문제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불이익과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이번 12 월, 선택의 중요성이 요구됩니다.

⑧ 정민희(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우리나라의 헌법 제 119 조 ①항과 ②항의 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2 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이 헌법 ①항과 ②항의 조문은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계층 간의 분열과 갈등, 또 양극화 시대 안에서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의 유기적 조절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 정당이 경제민주화를 정략으로 내세운 결과입니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이에 대한 실현 방법 중 하나로 재벌개혁의 문제도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새누리당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
출총제 도입·순환출자 금지	없음	도입 및 확대
재벌총수 임원·지배주주 횡포 방지	엄정 법집행·사면권 억제	형량 상향 조정·사면권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확대도입	확대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중대 담합행위에 도입	
일감몰아주기 근절	정기직권조사 형사고발	명문화·고발의무화
중소서민 상권 침범 제한	중소기업 점유업종 재벌 진출 금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강화
불공정하도급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권 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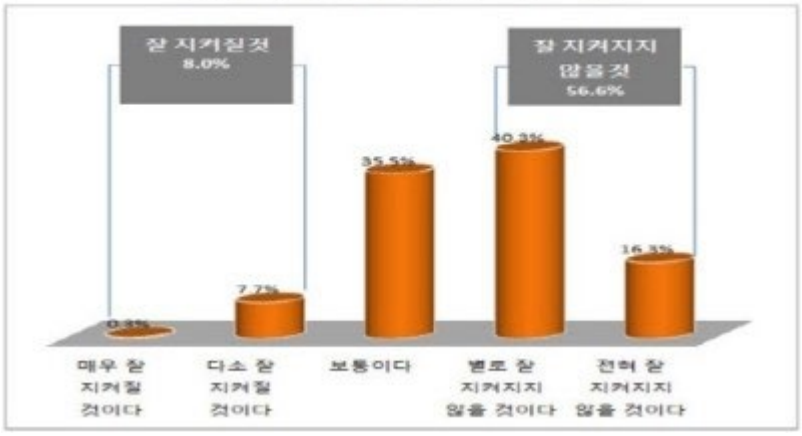
자료:경실련

저는 이러한 모습이 항상 반복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후보나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는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지만 막상 임기가 시작되면 이러한 말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한국 사회에 1 억 원 이상의 연봉자나 재산가치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산가들이 30 만여 명이고 정치인들의 다수는 이 그룹에 속한다고 합니다. 온갖 경제민주화를 외치다 집권 전에 총선, 대선자금, 대북정책, 세계화 등을 언급하며 겉으로 재벌을 때리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익을 남겨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 정치를 변화시키겠다고 나오는 사람들도 결국은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 재산을 가진 자산가입니다. 기성 정치를 엎으려면, 또 정치권에 들어오려면 이런 재산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에 대한 의견 >



저는 경제민주화를 외치기 이전에 정치인들이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위장전입, 불법투기, 탈세, 불법 상속증여 등은 발각 즉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치후원 기부금, 출판기념회, 정치인 진입에서부터의 재산 정도 등을 공개해서 깨끗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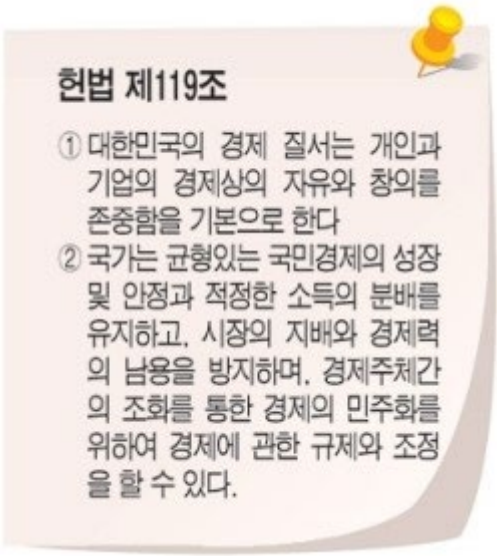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은 자신의 얼굴도 씻지 않은 채 남의 얼굴만 씻으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언급하기 전에 자신들의 정치 시스템을 민주화 시켜야 하지 않을지 또 그러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들여서 말하고 버려져 버리는 공약보다 먼저 정치인 민주화를 보여주어야 헌법에서 주장하는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요?

⑨ 정예연(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최근 정치권에서는 헌법에 나와 있는 모호한 경제민주화 조항(119 조 2 항)을 들먹이며 마치 경제정책을 통한 성장과 사회적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유시장 체제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전제로 분배와 사회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보장하며 시장기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부개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개입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개입의 방법과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요즘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문제들을 지적하며 다양한 기업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정당에서 이 같은 기업 정책을 앞다퉈내놓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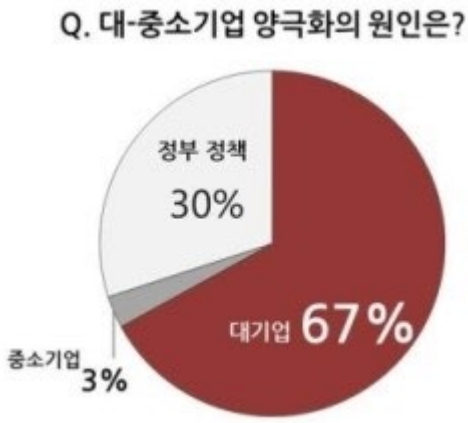
그러자 일부 정당에선 헌법 제 119 조 2 항을 전면에 내세워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이유로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단순히 경제정책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국가개입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지요.

물론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의미는 그 자체만 놓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구조를 파악한 뒤 그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 제 119 조 1 항과 2 항의 관계는 원칙과 보완의 관계입니다. 즉 원칙이 아버지라면 보완은 어머니인 셈입니다. 제 2 항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나 국가개입은 사유재산 제도와 개인의 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차원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은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생산, 소비, 고용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분배를 위한 사회복지에 대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권이나 생활무능력자의 국가적 보호, 최저임금제, 교육 받을 권리 등을 통해서 기본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중소 기업 관계에서 중소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이들을 사회적약자로 보고 보호하려는 정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경제 틀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보호, 분배, 사회정의와 복지 등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사회적 시장질서' 개념과 동일시하며 '사회적'이라는 정책목표를 강조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나 중소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막아야 되고 이를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겉으로 볼 때는 위법이고 불공정해 보이는 행위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업사회가 발전한 현대사회의 경우는 정상적인 기업 행위를 위법 행위로 잘못 판단할 오류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의 정책들은 국가개입의 '필요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잉규제의 위험성이라는 '한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개입이 강조된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119 조 1 항과 2 항이 서로 대립관계가 아닌, 제대로 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보완하는 규정으로 바라보아야 제대로 된 사회복지정책 구현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대기업의 행위와 소유지배 구조를 사전에 직접적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나 독점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도 전에 제재나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전적, 획일적 행정 규제들은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쟁행위까지도 차단하여 과잉규제를 만들고 기업 간 거래의 최대 수혜자인 소비자의 이익이 오히려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체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역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임시방편 정책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훼손하지 않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균형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는데 노력하는 논의를 통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⑩ 채련(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한국선진화포럼에선 지난 5 월 24 일 '경제민주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월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경제정책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란 말 그대로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경제의 민주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아이러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소위 재벌체제로 인해 나타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형식적,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그 대가로 상류층에 대해 편향된 수혜 체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1970~1980 년대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측의 기업 지원이 이어진 가운데 특정 기업의 비대화를 초래하며 재벌 형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후에 경제적인 세계화와 정치적 민주화가 거대 재벌을 고착시키는데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재벌은 정부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급속히 이루려던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이렇게 발전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경제 계획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시장에 개입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를 해외 학계에서는'발전국가' 형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지배된 시장의 틀에 맞춰서 국가의 대표 기업을 육성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면서도 기업의 위법을 감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1970 년대 정부의 기업 지원은 국가적 장기 경제 운용 계획 아래서 육성 산업분야를 섬유와 신발과 같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선정하여 시장진입, 제품생산, 사업확장 등 광범위한 기업 활동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출 전략 산업과 그의 생산 및 수출목표를 설정하면, 기업은 정해 놓은 수출 목표량을 달성하는 방식으로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형태였죠.

정부가 할당한 목표에 뒤처지는 기업은 시장에 앞서 정부에 의해 퇴출되었고, 맡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은 다른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정부지원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은 정부의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몇몇 소수 기업들에게 집중되었고, 이들은 곧 수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린 재벌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화 기간 동안 정부는 주요 산업에서의 기업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제한, 인허가 제도, 관세 및 비관세의 수입 장벽을 유지함으로써 신규진입을 억제했고, 이는 기존 기업의 확장과 동시에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할 때마다 재벌들이 기존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일단 유망 산업에 진입하고 보자는 식의 소위 문어발 경영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낙후된 산업과 부실 및 도산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자 법정관리와 기업합리화 방침을 여러 차례 활용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조정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재벌의 막대한 규모 팽창을 단기간에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외치던 1970~1980 년대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재벌의 규모는 더 이상 정부 우위의 수직적인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기업을 크게 성장시켰고, 그 거대해진 기업은 이제 오히려 정부의 수행해야 할 일을 기업이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재벌이 분담하게 끔 요구하는 모습은 현재의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된 것에는 '세계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체제를 옹호하는 측면에서는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서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의 대형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재벌체제는 우리가 수용해야 할 현실로서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벌옹호론의 대부분의 내용은 재벌에 대한 모든 규제를 배격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재벌을 오히려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재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재벌 때문이 아니라 금융·노동·상품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현재의 재벌에 대한 규제 노력을 폐기하고 대신 전반적인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촌 경쟁시대의 도래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개입 정책들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재벌에 발목 잡혀 있으며 그로 인해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논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요구하는 한편, 재벌의 문제가 자체 기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의 위기, 고용 불안, 소득불균형 심화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 양극화 문제로 심화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의 민주화도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급진적인 민주화와 산업화는 빠른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공정한 경쟁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대기업에 의해 급성장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을 이제는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균형과 안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이제는 공정한 자격을 쥐어주고, 서로 협력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생의 시장경제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재벌체제라는 대기업 몰아주기 식의 구식은 벗어버리고, 아래부터 탄탄한 기업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과 인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양극화의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경쟁상대는 더 이상 국내 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이루어진 현재 경제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협력해서 국력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⑪ 최아셀(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최근 유통산업 발전 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월 2 회의 의무휴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동네에 있는 대형마트들도 건물 앞에 의무 휴업일을 크게 적어놓아 고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까지 파고 들면서 소상공인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측에선 이 같은 조치로 자신들이 매출 손해를 보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래시장 관계자들은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각을 보면 대형 마트들이 휴무를 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의 짐을 지어주고 있는데, 이번 의무휴업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휴무일이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마트 종사자들이 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지켜달라며 시위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마트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잇는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7 조(의자의 비치)를 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등의 규정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 근로자들이 건강권 위협, 고용불안, 감정노동 강요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무 휴업일을 통해서 마트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삶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대형마트의 독식과 횡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마트들로 인해서 지역의 재래 시장 상권이 죽어간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의무휴업을 지정해 줌으로써 그날만이라도 근처 재래시장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 재래시장은 근처 SSM 의 휴무로 1 주일 전보다 매출이 20~30% 증가했다며 의무 휴업일을 반겼습니다.

▶또한 야간영업을 하는 대형 마트들에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에너지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4 시간 운영하는 마트에 가보면 거의 고객이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등의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형마트들이 도심 외곽에 자리잡도록 규제하고 있고, 심야 영업시간도 제한하여 심야시간에 동네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들은 대형마트 의무 휴무가 시행되었지만, 고객들은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요즘 소비행태를 보면 대부분 맞벌이 가정으로 회사가 쉬는 주말에 다같이 장을 보러 가는데 주말에 마트가 문을 닫게 되면 어떡하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무리 재래시장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시장상인들의 불친절한 서비스나 위생상태는 거기서 거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즉, 아무리 장을 못 보는 상황이 된다 해도 비위생적이고 무질서한 재래시장에는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한다면 대형마트 의무휴무가 아니라, 재래시장 상인들의 철저한 위생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주차 등 자체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강제적 의무휴무 조치보다는 고객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같은 경우 의무휴업일 매출 빠짐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마트 역시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인터넷 쇼핑몰인 이마트몰의 대대적인 광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가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저 소비자들의 불편만을 초래할 뿐이지 않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영업규제로 인해서 대형마트들이 근무 인원을 대폭 줄이면서 졸지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제 주변에도 주말마다 마트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며 용돈을 벌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며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의무휴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10%나 줄었기 때문에 인력감축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경제권을 빼앗고있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란 균형 있는 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시장제도와 시장규칙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해당 실패를 야기하는 재산권 보호 실패를 시정하는 선에서의 개입이어야 하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경쟁을 없앰으로써 재래시장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 게 아니라, 그들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있도록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역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제한이나 독식을 통한 모습이 없어지고, 서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WIN-WIN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최근에 열린 경제신문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을 이끄는 재벌들에 대해 변화를 촉구했다. 덧붙여 대기업의 문화가 재벌 총수 문화와 맥을 같이 하기에 재벌 스스로 바뀌어야 진정한 대기업의 문화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관심 역시 경제민주화에 쏠리게 되었다. 우리 대학생들 역시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고려대학교(세종)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도 경제 민주화를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토론 전문

■김은정(2 학년): 요즘 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 민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요구하는 것으로는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기회의 제공, 기업 성장 위주가 아닌 실질적 국가 성장과 분배의 안정성, 적극적인 규제와 통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재벌 개혁에 대한 논란 역시 뜨겁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역시 재벌개혁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벌개혁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자신만의 창의성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물을 제 3 자가 양극화를 이유로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백승원(2 학년): 저 역시 그 말에 동감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내세우며 재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재벌들을 보면 그들 중에는 과거에 누구보다 힘든 경험과 생활을 겪어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개혁과 개선으로 지금의 성과를 이루어낸 그들을 맹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임지현(2 학년): 하지만 대기업들에 대한 비난이 단지 재산이 많아서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종 비리사건 등에 연루되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탓도 크죠. 특히 끊이지 않는 재벌 특별사면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지원 속에 성공한 그들이 국민을 업신여기고 배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도나은(2 학년): 그렇습니다. 재벌들의 행위가 비난 받아야 할 경우에는 비난을 받아야 하며 칭찬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칭찬해주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도 재벌들만의 개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경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기업의 역할이 컸던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의 노력을 비난하는 것은 책임을 떠 넘기자는 식의 비난이 아닐까요?

■이예준(2 학년): 물론 자신의 실패나 손해를 대기업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아무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실패를 가져다주는 일은 흔합니다. 이러한 실패도 뛰어넘는 자가 진정한 승자겠지요. 하지만 대기업의 독점이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해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규제와 통제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임지현(2 학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제와 통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 법의 개입보다는 대기업 스스로의 변화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대통령도 이제는 무한경쟁이 아닌 따뜻한 경쟁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패배자에게도 기회를 다시 제공하며 협력하는 순간, 진정한 공존과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며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김은정(2 학년): 앞서 말했듯이 재벌에 대한 타당성 있는 비판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은 사라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선진화를 바라보는 국민으로서 이제는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의식까지 함께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재벌과 관련된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우리 스스로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맹목적 비난이 아닌, 타당성 있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사실을 판단하려는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② 한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세학(멀티 3): 함께 한국선진화포럼 5 월 월례토론회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동영상을 보고 나서도 경제 민주화란 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란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현학(광고홍보 3): 솔직히 동영상 내용 자체가 어렵네요.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하향식 경제학이나 상향식 경제학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동영상에서 마지막에 나온 질문과 답변을 보면 재벌들의 강점 또한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의 재벌들은 1960~1970 년대에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특혜 받은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태준(광고홍보 3): 그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지금의 대기업들이 탄생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기업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소수 대기업들의 구조는 바뀌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대기업을 죽이자는 행동은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세학(멀티 3): 질문 중에 공생적 시장경제가 실현되려면 재벌규제를 하되, 무모하게 접근하지 말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윤호(경제 3):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개발 지원, 세제지원을 통한 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하청업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공동성장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김지혜(멀티 4):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당장 취업에 나서야 할 저만 해도,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을 가고 싶어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월급, 복지에 대한 혜택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창업을 적극 지향하고, 청년들의 인식이 좀 더 바르게 되었으면 좋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대학생들의 생활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졸업을 하고 취업 후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실정에 무슨 '청년 창업'이 가능할까요? 또한 중소기업에서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면 학자금 대출 갚기에도 벅찬 실정입니다.

이세학(멀티 3): 잠시 논점을 빗겨나가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분명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대기업 쏠림 현상을 청년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지적하는 점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와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죠.

이유나(멀티 4): 영상을 보면서 경제 민주화란 결국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점에서는 역시 공정경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학(광고홍보 3): 또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직업교육의 강화, 무상교육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진영(멀티 4): 대기업들과의 상생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누구 하나 귀속되는 것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세학(멀티 3): 결국 공정경쟁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 기회의 공평한 배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해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토론을 마지막으로 선진화 스터디 모임 1 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 동안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미디어영상의 남해영 양이 선진화 스터디 모임 2 기를 주최할 것인데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③ 전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정하: 19 대 국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총선 공약으로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 최대이슈는 경제민주화를 어느 선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하여 우리 스터디 조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군요. 먼저 봉성군부터 이야기 해주세요.

■김봉성: 경제민주화란 말 그대로 분배, 공생을 큰 틀로 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이번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정하: 네,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없나요?

■김봉성: MB 정부 들어 친재벌 정서가 짙어졌고 기업들이 특혜를 보면서 그에 따라 하위그룹에 존재하는 중소기업들과 중소상인들이 불이익을 많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빈부격차 역시 심해졌고요. 경제민주화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 나타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마다 이를 적용하는 범위가 다른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로서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송현: 총선 공약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인 것은 맞지만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의 횡포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폐해를 많이 보았잖아요. 학교에서도 지금 시위하던데..

■배상아: 네, 새누리당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온 것 보면 확실히 분배가 최대 이슈인 것은 틀림없네요. 근데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가 여야가 갈등하는 상황인 것 맞죠?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범위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는 재정건정성이 유지되고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죠!

■최재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이번 경제민주화에 큰 틀로 보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배상아: 저는 솔직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들을 위하는 정책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조치에 따른 소비자 입장은 생각 안 하나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휴일에 쉬게 한다고 해서 과연 재래시장 장사가 잘 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 전날인 금요일날 가서 왕창 살 것 같거든요.

■최재원: 저도 상아랑 같은 의견이에요. 저희 집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영업규제랑 상관없이 하루 정도 날 잡아서 마트 가서 장보고 오거든요. 아파트 주위에는 가끔 정말 급할 때 가서 사지 일반적으로는 마트 가요. 그리고 집 근처는 비싸요. 대형마트엔 마일리지 적립카드도 있고. ^^

■배상아: 맞아요. 제일 처음 대형마트 규제한다고 해서 친구들과 이 정책은 '오버'라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골목상권의 매출이 과연 오를 것인지를 두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대형마트 막으니깐 금요일쯤에 대형마트에 사람들 많이 몰리고 해서 좀 짜증나는 경향이 더 있었죠.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김봉성: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그 결과는 알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대형마트가 독주를 하며 장사한다면 골목상인들이 더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좀 더 근본적으로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송현: 저도 봉성 오빠말대로 주변 상인들도 같이 이익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의 취지는 좋은데.. 그 결과가 효과 있을지는 정말 의문이에요. 골목상권 활성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친 오빠가 집 근처 시장상품권 만 원짜리 두 개인가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멀어서 갈 일 없다고 그냥 놔두더라고요. 골목상권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마련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배상아: 또 재벌 빵집들 규제하는 정책도 있었잖아요! 저 그거 보고 정말 어이없었어요. 솔직히 그런 빵집들은 골목상권보다는 백화점 내에 있잖아요. 어차피 백화점 내에서 사는 사람들만 사지 않나요? 저는 한번도 백화점 안에서 빵 비싸서 안 먹거든요.

■최송현: 근데 파리바게트, 뚜레주르 등 대기업 빵집들 거리제한 둔다고 한 정책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일반빵집하나 있었는데 파리바게트 생기고 나서 정말 그 빵집 망했어요. 솔직히 맛이랑 질? 이런 것들이 대기업 빵집들이 나을 수가 있지만 일반 상인들 장사 안 되는 것 보면 마음이 아파서요. 그 집 아줌마도 어디 일하러 다닌다던데.. 좀 많이 실감했어요.

■배상아: 아, 저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는 지방이라서 파리바게트 뚜레주르가 눈에 거슬리게 많진 않지만 서울에 놀러 가보니 정말 서울은 버스 한 정거장 지날 때마다 2 개, 3 개씩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서울이 확실히 심한 것 같아요.

■김봉성: 우리는 광주에 살고 저도 집이 순천이라서 시골이지만, 대도시로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한 것 같기는 합니다. 시골에서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비슷하거든요.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빈부격차, 양극화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진 못했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분배, 상생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원 : 분배라든지 상생, 이런 모든 가치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좋아요~ 이상적이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좀 현실이랑 먼 느낌이 난다고 생각해요. 분배 이전에 성장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 봐야지 좀더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분배 상생만 고려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배상아: 제 의견도 언니랑 비슷해요! 앞선 무상복지랑도 비슷한 내용인 거 같은데, 분배와 상생도 중요하지만 이 틀이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쟁력 있는 성장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분배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거죠.

■최송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재벌위주의, 그리고 성장위주의 정책이었잖아요. 민심은 돌볼 겨를이 없었고 빈부격차는 통계만 보아도 더욱 늘어나고.... 이번 MB 정부 들어오면서 친기업 정책과 4 대강 사업으로 많은 부분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오만 있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봉성: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득권 세력이에요. 사회의 부를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으니 분배하기 싫은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회의 부를 누가 가져다주었습니까? 바로 국민들 아니겠어요? 다시 환원할 의무가 있어야죠. 적어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실천하는 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그런 기업이 거의 없죠..

■최송현: 기업이 하는 사회 프로그램 또한 결국에는 마케팅이죠.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걸 보면 기업의 이익은 고루 나누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결단력 있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하구요.

■배상아: 하지만 그런 정치인들조차 기득권 세력이지 않나요? 박근혜도 기득권이고..

■김봉성: 그러니까 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로 정해지느냐가 중요하지! 민주당과 새누리당만 봐도 큰차이가 있잖아. 새누리당은 좀 소극적인 반면 민주당은 적극적이고..

■배상아: 저는 항상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가치가 분배와 상생이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상황과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70 년대가 아니니깐 국민들의 희생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송현 : 저도 상아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개혁을 좀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대기업만 잘 사는 경제성장이냐, 다 같이 잘 사는 경제성장이냐인데… 저는 후자입니다!

■최재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만 보아도 다들 대기업이나 대기업 못지않은 중견기업에 취업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르지 못한 분배 때문에 취업하기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대기업만 가지 말고 중소기업으로도 눈 돌리라고 말하는 정부를 보면 “그럼 사회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던가!”라고 소리지르고 싶어요.

■김봉성: 하긴 그건 그런 것 같기도 해. 주위의 애들 보면 다들 대기업 가고 싶어 하잖아. 결국 대기업은 끝까지 살아남을 걸 알거든.. 자금이 많으니깐. 경제민주화가 좀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더욱 확신이 드네.

■이정하: 신기하게 초반에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대해서 적극성과 소극성 두 부분을 보인 것 같았는데 끝에 갈수록 다들 적극성에 가까워진 것 같네요.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프렌차이즈 규제,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관계 등 다양한 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마지막인 만큼 재미있고 즐겁게 토론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④ 청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올해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될 ‘경제민주화’는 그 방법론을 놓고 여러 시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양극화라는 큰 문제가 던져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 재벌개혁, 공정경쟁, 노동시장 보호, 조세개혁 등 많은 정책과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경제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점과 국가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둘을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청주대학교 선진화 스터디 모임에서는 학생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해 보았다.

■정예연: 이번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만한 주제입니다. 최근 복지국가와 더불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민생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라서 우리 학생들의 전공이 다 다르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각자가 고민하고 조사한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 제 119 조에 보면 제 1 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 2 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기초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이 헌법의 해석을 놓고 자유시장경제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이라는 두 측면이 상충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란 무엇을 말한다고 보시나요? 간단하게 말해봅시다.

■이철우: 저는 경쟁을 위주로 할 것인가, 정부가 규제와 개입을 통해서 분배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성장이냐 분배냐 문제로 얼마나 정부가 개입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성모: 경제라는 단어와 민주화라는 말이 혼합된 것 같은데요. 시장경제 원리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것 같습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임세혁: 파이를 키울 것인지 나눌 것인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안준철: 이미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해왔는데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 일감 몰아주기 등 왜곡된 경쟁 체제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태식: 저도 대기업 중심의 문제,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황윤미: 경제민주화는 두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자유시장과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규제를 통해서 정당한 분배를 하자는 것입니다.

■정예연: 경제민주화를 정의하다 보니 대기업 문제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과연 대기업이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토론해봅시다.

■이철우: 과거 박정희 정부 때 계획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기업이 받은 혜택을 이제는 사회에 좀 돌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는 무조건 대기업을 압박하기보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클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예로 들면, 창업하는 이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실패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도전하는 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줍니다. 우리도 국가가 더 나서서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 밑에서부터의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성모: 대기업 위주로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의 우리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의 비율은 75% 이상을 차지하며 종사자 수도 75% 이상이 중소기업의 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기업이 자본을 쥐고 있다는 것인데, 중소기업이 더 튼튼해야 합니다. 중산층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독점이 심하다면 규제가 필요한데, 특히 탈세 같은 것은 철저히 잡아내야 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세금을 잘 걷어 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예연: 대기업을 심하게 규제하거나 직접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문제인 듯합니다. 대기업도 정당하게 돈을 번 기업이라면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세혁: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가 대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국민이 투자한 돈으로 수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수익의 사회환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 앞에서 말한 편법적으로 절세를 하거나 탈세를 하는 문제는 제대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준철: 저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이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용어와 정치용어가 혼합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70% 넘게 세금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을 위하는 제도가 많은 곳도 없습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무조건 대기업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도 많이 마련돼 있는데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잘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태식: 우리나라는 고속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만 주다 보면 글로벌기업의 국가 브랜드가 창출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저는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을 침범하는 것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것도 해소해야 합니다. SSM 문제만 봐도 대기업 자본이 동네 슈퍼들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예연: 글로벌 국가브랜드를 창출하셔야 된다면서도 SSM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이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고 증원해야 유연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둘의 조화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황윤미: 제 주변을 보면 너무 대형마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대형마트 영업이 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찬성하는데 정부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예연: 대형마트 휴업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형마트 휴업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찬성 네 분. 반대하시는 분? 다섯 분이시군요. 그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성모: 시장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맞는 것일까요?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세혁: 서민들을 위하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요즘 보면 일요일에 휴업하면서 주말 시장을 봐야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만 줍니다. 또 그러면 토요일에 시장을 보러 올 텐데, 내일은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더 많은 과소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태식: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강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선 안 되고요.

■정예연: 철우 학생은 찬성하였는데 제가 반론을 드리자면 대형마트 휴업이 오히려 주말 일요일에 살 권리, 다시 말해 고객이 필요할 때 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철우: 저도 사실 그런 규제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지요.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통을 예로 든다면 대기업은 판매 창구가 많습니다. 완제품이 만들어지기 까지는 너무 대기업 품목이나 제품을 사용해서 쓰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품종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품종을 30%이상 납품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예연: 제가 하나 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황윤미: 음, 아무래도 소비자는 당연히 더욱 품질 좋은 대기업 제품을 선택하게 되지요.

■안성모: 대기업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 아무리 싸고 좋은 품질을 내놓고 싶어도 경영 사정상 그럴 수도 없습니다.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으로 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고 또 대량으로 판매하여 싸고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황 자체가 대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예연: 마지막으로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요약해 봤는데요. 이것이 어떤 쪽이 나은지는 각자 개인의 정치성향이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혹시 이 정당들이 내놓은 정책 중에 의견 주실 분 있나요?

■황윤미: 통합민주당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한 가지 지적해 본다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대기업을 규제하는 데에만 쏠려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성모: 저는 새누리당의 경우 여러 정책 가운데 자본소득 과세 강화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액투자자들 또한 같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형평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수 확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예연: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과연 시장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지, 또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 등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이슈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민심을 잠깐 현혹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논의의 장이 앞으로도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토론 끝내겠습니다.

선진화 과제 3:

故 芝巖 선생의 비전과 유산

-대한민국 선공신화의 세대 간 공유

(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I)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강유정(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한국의 경제발전은 유래 없이 짧은 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흔히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는 표현들로 한국 경제발전의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이에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 창립 10 주년을 맞아 '故 芝巖 선생의 비전과 유산 -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세대 간 공유'라는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제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제자 안병직 교수는 한국 경제발전의 특징으로 후발성과 고도성장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제협력노선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융흥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 유장희 교수는 한국의 고도성장 이면의 요소들 중 특히 인적자본과 높은 교육열, 제도적 유연성과 지도층의 추진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덕분에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이 가능해 세계사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혁찬 학생은 월남파병과 개발독재, 경제정책의 개인적, 기업적, 그리고 정부적인 역할이 힘을 합쳐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현재의 경제적 위기도 이와 같은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경제발전을 통해 앞때보는 앞으로의 과제

토론자 유장희 교수는 '잘 살아보자' 정신의 국민적 역량과 자각의식이 강했던 교육열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발전의 의의는 오늘날 한국의 또 한 번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써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 중 대표적으로 국민적 통합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에 대해 고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걸림돌들이 많지만, 다양한 문제들의 근본에는 사회적 불안과 불신이 깔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한국을 발전시켰던 성공 요인들을 오늘날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로 모였던 국민적 염원과 열성적인 교육열을 통해 또 한 번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시민의식교육을 통한 선진사회로의 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장은 이루었다고 평가받지만, 그에 비해 시민의식과 같은 요소들은 저평가 받습니다. 선진경제와 더불어 선진사회의 정착이 뒷받침되어야 또 한 번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준법교육 등을 통한 시민의식교육이 단순히 이론위주가 아닌 현장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쌓은 현장실천적만인 역량을 바탕으로 정치나 경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와 국회에 대한 방관적인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선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냈던 과거의 한국경제발전의 시기처럼 시민의식교육을 통해 선진사회를 위한 국민적 역량을 키우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장려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간다면, 선진경제와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② 공수진(광운대학교 행정학과)



한국의 국가브랜드

대한민국은 1950 년 6.25 전쟁 이후 페허가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땅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GDP 14,351 억$로 세계 11 위의 경제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故 芝巖 선생의 비전과 유산 -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세대 간 공유'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경제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신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의 60, 70 년대 경제 발전의 과정을 듣고 이에 대한 세대 간의 토론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경제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경제 발전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것입니다.

우선 안병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경제사적 시각에서 한국 경제발전은 선진자본주의와의 국제적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고도 성장이며 이런 고도 성장의 요인으로 무역, 해외저축, 기술도입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G20 의 초대의장국으로서 세계중심국가의 하나로 발전한 것은 한국이 국제협력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장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인적자본과 높은 교육열, 제도적 유연성과 적응능력, 지도층의 추진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전횡, 취약한 중소기업, 금융의 후진성, 소득의 양극화 등의 문제는 한국 경제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권혁찬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16 기,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은 한국이 60, 70 년대 위기와 혼돈의 시기를 이겨내고 성공한 것은 월남 파병, 박정희 대통령의 민간 기업이 주축이 된 개발독재, 정부의 수출 주도형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60, 70 년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한 것처럼 한국이 개인, 기업, 정부가 하나된 모습을 보인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발전은 선진자본주의와의 국제적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고도 성장이며 이런 고도 성장의 요인으로는 무역, 기술도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원빈국인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무역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한국의 무역은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70 년대에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대내외적으로 정책을 잘 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정책을 편 것은 시대상에 맞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시대상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경제성장률은 3%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주가 폭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산업을 육성해온 한국이 지금 가져야 할 것은 세계의 흐름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도성장을 이루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펼치는 외교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국제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60, 70 년대 절대 빈곤을 벗어난 것은 수출 주도의 경제개발계획 덕분이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더욱 국제협력 노선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글로벌 표준화입니다. 법과 제도를 세계의 흐름, 기준에 맞추어야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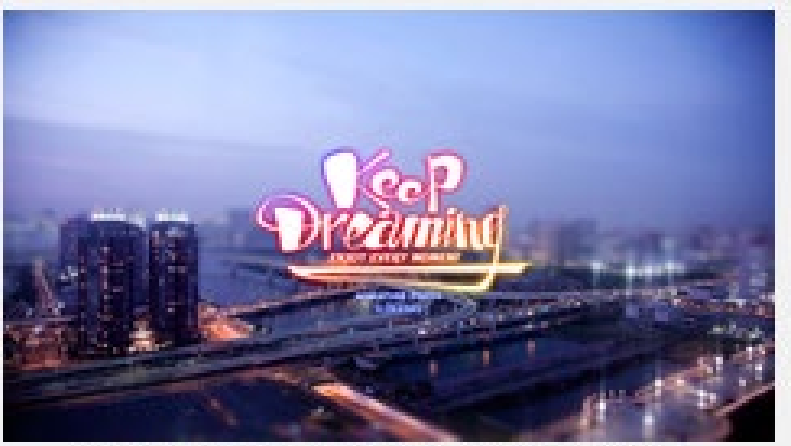


모두가 하나되어 경제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경제 발전이라는 큰 목표로 정부는 법과 제도를 글로벌 표준화시키고 국민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 움직인다면 한국이 다시 한 번 고도성장의 길에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지도층의 추진력이 더해진다면 안정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발전의 큰 틀을 짜고 그 안에서 국민들 모두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수행한다면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아지게 되고 이는 선진경제창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③ 권새암(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제발전을 돌아보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국선진화포럼 10 주년 기념세미나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고 지암 선생의 비전과 유산 -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세대 간 공유라는 세미나에서 3 개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세 주제 모두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새마을 운동의 의미와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은 현재 한국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당시 농촌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곳도 별로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새마을 운동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진행할 때의 농촌 상황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독재와 연관되어 있다는 뉘앙스의 정보가 많이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의 농촌 경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극심하고, 시설도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하게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농촌 경제가 새로운 경제 상황에 맞는 변화를 겪지 않는다면 외국 농산물에 밀리게 되고, 자칫 잘못할 경우 한국의 농촌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농촌은 낙후와 경쟁력 상실로 경제적 여건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농촌 경제가 위에 서술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거 매우

피폐하고 낙후되어 있던 농촌을 바꾼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깊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는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가 시작했습니다.

좌승희 교수는 먼저 현대의 경제학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주류경제학만으로는 한강의 기적과 새마을 운동을 통한 한국의 도농 경제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은 불완전하여, 시장만으로는 한국의 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한국은 정치의 경제화를 통한 경제적 차별화를 진행하여 시장, 정부, 기업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경제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장 원리인 경제적 차별화를 적용하여, 성과 있는 자에게 상을 내리고 성과 없는 자에게 벌을 내리는 신상필벌을 철저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바로 이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한 시장화 운동이었습니다. 성과를 내는 마을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마을을 구분하여 성과를 내는 마을에게만 지원을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였습니다.

성과가 미흡한 마을에는 하나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너무 불평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나, 모든 마을이 마을 발전을 위해 열심히 참여하여 농촌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마을이 스스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경쟁을 통해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만약 성과가 미흡한 마을도 지원했다면, 성과가 미흡한 마을은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소정의 지원에만 만족하고 별다른 노력을 안 했을 것입니다.

고병우 한국경영인협회 회장은 새마을 운동이 가난한 농촌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마을이 새롭게 변하고 길이 넓어지고 기울어져가는 초가집이 새 건물로 고쳐지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하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can-do-spirit 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 태도로 경제발전,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발판이었습니다. 또 고 회장은 가난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어, 그 사람이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달해주었습니다.

김수빈 서울대학교 학생은 현재 성장률이 감소하는 한국 경제 상황에 새마을 운동의 교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철저한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를 갖추어야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고, 생산력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하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사회에 대한 회의적 인식, 그리고 정치인들의 과도한 표 의식은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새마을 운동의 교훈인 '하면 된다.'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의 이런 측면들을 몰랐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어떤 곳에서도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당시 농촌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마을 운동의 원리인 경제적 차별화, 즉 시장화 운동에 대해선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시장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된 운동이었고, 분명히 농촌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시장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장 원리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장 원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보장한다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법을 찾아보면, 성과를 내는 자에게 상을 주는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나날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에서는 신생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지위를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가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모순적입니다.

잘 성과를 내서 성장한 기업에게 지원을 줄이는 건, 잘 하고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봐야 돌아오는 건 줄어든 혜택인데, 누가 피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현행 제도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에 점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기업들이고, 많은 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의 성장을 격려하는 제도는 별로 없습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마을 운동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유인 구조, 시장의 원리를 적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과거 대한민국이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일구어내었을 때처럼, 다시 '할 수 있다.',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많은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확산시키면 한국의 경제 동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선진 경제를 창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④ 권혁찬(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대한민국은 지난 50여 년간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50 여 년간 대한민국은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신속하게 이뤄지는 바람에 현재의 세대는 불과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빈곤에 허덕이며 피땀을 흘리며 노력했다는 사실에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과거 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가치관이나 신념이 언뜻 현재에는 필요치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재)한국 선진화 포럼에서는 올해 창립 10 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 성공신화를 세대 간에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지난 9 월 1 일, 지암 선생의 비전과 유산 -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세대 간 공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의미와 평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 발제자인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는 박정희 시대의 성공 원리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신상필벌로 꼽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장의 차별적 보상기능을 보완하고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신상필벌은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인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은 우리가 가난한 나라의 농촌에서부터 Can Do 정신을 확립한 것이 가장 큰 새마을 운동의 수확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빈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15 기 학우는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인 시장구조를 이용한 유인구조를 통해 현재 위기상황을 맞은 한국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사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GDP 대비 정부부채가 처음으로 40%를 넘어섰고 이 수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의 도약은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의 투자은행들은 한국을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도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툭하면 터지는 북한의 전면전 위협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시하는 해답은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흔히 새마을 운동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침부터 노래를 틀어대며 체조하는 것, 혹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정신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침부터 노래를 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자는 구호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신상필벌의 시장의 인센티브 구조를 새마을 운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는 사람들을 협동하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결코 쉽거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새마을 운동뿐 아니라 60,70 년대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어느 한 순간도 고단하고 어렵지 않은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장의 경쟁과 인센티브 구조는 치열하고 냉엄합니다. 열심히 일한 자는 보상을 받게 되고 나태한 자는 그렇지 못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를 흘리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결국 해내어 OECD 회원국이 되고 무역 대국이 되었으며 선진국의 문턱까지 쫓아온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뤄낸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핫이슈이자 대통령의 최대 역점사업인 4 대 개혁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로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며 청년실업문제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얻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잃는 것은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노동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느냐, 아니면 다시 재도약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인 것을 느껴야 합니다.



치열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재도약을 이뤄내야만 한다.

따라서 정말 고통스럽고 고단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노동유연성 제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선 전진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이 시장을 활용한 것인 만큼 고용과 해고를 보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피를 흘리는 개혁을 완성해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가슴 깊이 느껴야 합니다. 자유로운 경쟁과 기업 경영을 보장하고 시장의 원칙을 다시 확립할 때 우리가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요?

⑤ 김다솜(건양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장기 경제불황으로 일확천금 도박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최근 경제 저성장으로 인해 길어지는 불황으로 평범한 시민들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권과 도박입니다.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을 적발했는데요, 여기서 1 년간 거래된 돈은 무려 500 억 원대라고 합니다. 또 합법적인 도박이 가능한 강원 랜드의 올해 2 분기 영업이익은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복권 판매 역시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팍팍해진 살림살이와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기불황이 계속되면 시민들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결국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공신화를 가진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이번 (재)한국 선진화 포럼은 창립 1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세대 간 공유라는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은 '경제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경제발전',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의미와 평가', '새마을 운동의 의미와 평가'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새마을 운동의 의미와 평가'주제는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가 발표하였습니다.

좌승희 교수는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은 자조하는 마을만 지원한 관치 차별화 정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정책 패러다임인 '정치의 경제화를 통한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농경사회의 시장화를 촉진한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인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은 새마을 사업의 모태로 농어촌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이 실시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 베트남, 몽골 등 가난한 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고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거짓 없는 정신이 필요함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 즉 'Can Do' 정신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수빈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2 학년 학생은 20 대 대학생의 입장에서 새마을 운동의 교훈을 어떻게 이어나가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에 대한 성과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지급 방식 도입과 낮은 출산율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유인정책의 제공, 소모적인 스펙 경쟁을 줄일 것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 주민들에게 자조정신을 일으켰다

새마을 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면 된다'의 자조정신과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느 샌가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성과를 내어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나 특정인을 손가락질하고 '낮은 성과에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평등주의적 포퓰리즘 정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이나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경제화를 통한 경제적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즉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들에게 더욱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대기업들은 대기업끼리, 이제 막 경쟁에 뛰어든 스타트 업 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은 그들끼리 경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 발전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와 취업난으로 회의에 빠져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에게 '하면 된다'의 자조정신을 반드시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개정하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라는 편견에 방치된 전문대들을 정말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잘 취업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자조 정신과 자립 정신으로 똘똘 뭉친 대학생들

21 세기에도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이어진다면 오늘의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시절 가난으로 고통받았던 것처럼 현재는 경제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조정신과 자립정신으로 똘똘 뭉친 대학생들을 양성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들에게는 보상을, 안 좋은 성과를 낸 기업들에게는 가차 없는 벌을 내리는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정책을 실천하고 'Can Do' 정신을 기억한다면 대한민국의 선진 경제 창조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⑥ 김덕규(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대한민국의 유산을 세대 간 공유할 수 있다면, 지금의 문제도 해결되겠죠?

대한민국은 1960 년대의 경제적 고난, 절대적 빈곤 속에서 단기간에 헤어나온 국가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경제 급성장, 다수의 공업 체제 개편 등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과를 세계가 주목합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려고 하는 등 그 관심이 대단합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 저출산, 저성장, 사회 양극화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성공 신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알아보고, 그 유산과 비전을 세대 간에 공유하기 위해서 한국선진화포럼 창립 10 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새마을운동과 같은 과거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제, 정치적 업적을 기리고 세대 간 소통하는 의미에서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故 芝巖 선생의 비전과 유산 -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세대 간 공유'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경제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의 주제발표자가 발언을 한 뒤, 경제 전문가와 대학생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주제발표자 안병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세계자본주의의 파동을 소개하며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강조했습니다. 무역, 해외저축, 기술도입과 같은 선진자본주의와의 국제적 협력 속에서 초고속 성장을 했음을 역설했습니다.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인적자본과 높은 교육열, 제도적 유연성과 응세능력, 지도층의 추진력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국가가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발전했고, 자원빈국이 자원부국과의 끊임없는 교류로 산업발전을 이룩한 점, 국토 양분으로 막대한 국방비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건실한 성장을 이룩한 것 등 세계경제발전사에서 한국 경제발전이 주는 의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권혁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은 우리나라가 과거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것은 월남 파병, 박정희 대통령의 민간 기업이 주축이 된 개발독재, 정부의 수출 주도형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은 과거처럼 개인, 기업, 정부가 하나된 모습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구조 개편은 제도적 유연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언급한 '제도적 유연성'이 인상 깊었습니다. 해방 이후 헌법을 6 번이나 바꾸고, 정부 조직도 개편되었고 세계경제의 추세에 맞추어 시장자유화의 방향으로 과감히 움직였습니다. 1 차 산업-경공업-중화학공업-정밀공업-정보화산업-서비스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 개편은 성공적이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물질적 발전과 함께 정신적 풍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도 과감히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는 유장희 교수가 언급한 훌륭한 인적자본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 공부량만 많을 뿐, 학습 효율 지수는 너무 낮습니다.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과거의 지식 전달형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예체능 과목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세계의 어느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압도적인 공부량을 내세우지만, 한국의 노벨상 수상이 학계에서 전무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 전달 위주의 '살아있지 않은 교육'은 휘발적입니다. 영어에 들이는 사교육비가 전체 GDP 의 0.6% 규모인 6 조 원에 달하지만, 외국인과 제대로 대화도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인생에 적용되고 녹아들기보다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승진을 위해 공부한 휘발성 지식은 단기간에 사라져버리기 쉽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학습에 대한 흥미는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OECD 가 실시한 2012 년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 및 읽기 항목에서 한국이 전체 64 개국 중 5 위를 차지했으나, 특정한 과제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아효능감은 62 위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죽은 교육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지식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토론 수업이 필요합니다. 유럽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토론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지속성에도 큰 효과가 있답니다.

목적은 바로 '생각하기'를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프랑스의 수능 중 철학 문제가 전 국민의 일상에서 화제가 되듯이 우리나라도 토론형 수업을 실시하여,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타개하고 열린 사고를 하는 국민을 육성해야 합니다.

특히 단계별로 철학을 가르치도록 하여, 생각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의 사상을 배우는 암기식 철학이 아니라, 차근차근 제대로 생각하는 방법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독일과 같은 성공적인 직업 학교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일처럼 직업학교를 활성화하여 전 국민이 고등교육을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모든 국민이 고등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왜 대학을 가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로 간주하고 편견을 받아야 하나요?

이러한 사고에서 벗어나 직업학교를 활성화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공부만이, 예체능계의 일류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국가가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교육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공통된 가치들을 공유하게 하며,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존재임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이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방법이자, 현 시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최고의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념 세미나의 주제, 우리나라 성공 신화의 세대 간 공유를 위해, 과거 산업 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교육 제도에도 수술이 필요합니다.

생각하기를 장려하는 창의적인 교육, 직업학교를 통해 삶의 다양성을 제시하는 교육을 통해 경제 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듯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선진 경제를 창조하는 지름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미래의 성공 신화를 개척하기를 기원합니다.

⑦ 나종문(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폐허가 된 땅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상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사실상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폐허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1 위의 경제 규모를 달성했으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故 芝巖 선생의 비전과 유산 -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세대 간 공유'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발전양상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6,70 년대 경제 발전의 과정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세대 간의 토론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제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경제 발전을 통해 미래 한국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안병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경제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 경제발전은 선진자본주의와의 국제적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고도성장이며 이런 고도성장의 요인으로 무역, 해외 저축, 기술도입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G20 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세계 중심국가의 하나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한국이 국제협력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의 성장은 인적자본과 높은 교육열, 제도적 유연성과 적응 능력, 지도층의 추진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전횡, 취약한 중소기업, 금융의 후진성, 양극화 등의 문제들은 한국 경제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권혁찬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16 기,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은 우리나라가 60 년대 위기의 시기를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월남 파병, 박정희 대통령과 민간 기업이 주축이 된 개발 정책, 정부의 수출 주도형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60 년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개인, 기업, 정부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인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발전은 국제적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고도성장이며, 이러한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적극적인 무역중심 경제정책과 기술도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0 년대에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대내외적인 정책들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시행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경제성장률은 3% 수준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한 중국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대중수출에 있어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흐름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기간산업과, 미래를 책임질 산업 모두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기반이 든든하다면 경제위기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리제이션이 가속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FDI 나 FTA 등 국제적인 투자나 협정들을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역행하기 좋은 국가라는 것은 알려야 합니다.

60 년대의 경제정책과 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 만큼이나 각자의 산업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하나되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과거 폐허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⑧ 박상희(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과거 경제성장의 요인을 현재 경제에 적용할 수 있을 까.

대한민국은 과거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한 국가입니다. 경제체제를 개편하고 산업화, 공업화를 이룬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세대에서 우리가 발전된 경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1 세기인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경제, 더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기성세대의 노력에 덧칠하여 또 다른 노력을 이룩해야 합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故 芝巖 선생의 비전과 유산 -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세대 간 공유'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경제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의 60,70 년대 경제 발전의 과정을 듣고 세대 간의 토론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 요인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새마을 운동으로 신상필벌의 원칙을 시장에 적용하여 농업의 발전을 이룩하고 계몽을 한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 및 한국 경영인 협회 회장은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신흥선진국으로 발전한 이유 중 하나는 CAN-DO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경제 성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라에게 CAN-DO 정신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빈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15 기 학우는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에 맞게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낮은 이유를 낮은 생산성과 노동력 문제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낮은 잠재성장률 속에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과거, 농업국가에서 머물지 않고 중화학공업, 제조업 등을 발전시켜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운 것입니다. 우리는 CAN-DO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대 미만으로 추락하여 2026 년에 이르러서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의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 고용하였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이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노동 생산성과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를 생각했을 때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1970 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주력산업인 제조업, 철강, 선박 등이 생산과 수출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CAN-DO 정신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중국의 알리바바, 샤오비 등 한 나라가 부가가치가 높은 글로벌 기업을 키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벤처 산업에 대한 지원이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창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다양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하루 1 만 개 이상의 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창업하는 데에 있어, 등록자본금 최소 요건마저 폐지하고 출자 방식이 자율화되었습니다. 즉, 1 위안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한 것이지요. 중국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돈으로 1 억 7500 만 원까지 창업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또 창업하는 지역에서 호적을 새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3 년 동안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우리나라는 창업진흥원이 실시하는 창업 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에 따르면, 최대 1 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업에 실패하면 지원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10 개월 후에는 다른 지원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위해 벤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정부가 창업가의 의견을 듣고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직접적 소통의 창구 자리가 많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국내적 투자 창구가 아닌 해외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우수한 사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신상필벌의 시장의 원리에 따라 발전한 벤처 산업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바탕이 된다면 CAN-DO 정신을 바탕으로 벤처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⑨ 송지나(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최근 IHS 이코노믹스와 독일 데카방크, 모건스탠리 등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3%, 2.3% 등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는 등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세를 띄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성장세 둔화와 중국의 무서운 추격으로 인한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수출액이 감소되는 등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의 미로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강의 기적과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70 년대 경제발전을 다시 살펴보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요인들과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지난 9 월 1 일 한국선진화포럼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영남대학교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좌승희 교수는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려면 1960-70 년대 지구에서 다른 어느 곳도 아닌 한반도 남쪽에서만 국민들이 자조, 자립 정신을 체화하고 하면 된다고 미친듯이 새마을 건설에 나서고 수출전선에 나섰는가에 대한 질문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좌승희 교수는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으로 정치의 경제화와 신상필벌의 차별화 원리 실천으로 농민들의 자조노력을 장려하고 의식을 진취적으로 바꾸기 위해 '자조하는 마을'만 지원하는 관치 차별화 정책을 꼽았습니다.



차별화 정책이 바로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이다.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은 '새마을 운동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부처를 장려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자기부담을 조금이나마 지게 하여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정책으로 농민들로 하여금 농특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찾아와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간다'며 청년들에게 세계를 지붕삼아 새마을 운동으로 성공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나라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15 기 김수빈 학생은 오늘날의 경제상황을 겪고 있는 20 대로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 새마을 운동으로 엄청난 속도의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노동력 문제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2~3%로 떨어졌고, 근면함에 비해 생산성은 높지 않으며 3 포 세대, 5 포 세대 등의 20 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벤처기업 장려와 규제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그리고 적극적 보육지원정책을 통한 낮은 출산율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제시하였고, 이 세 가지 정책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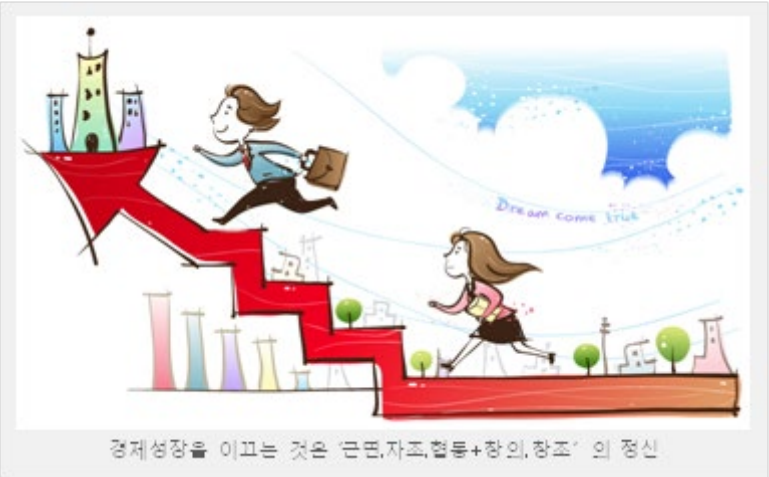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전망이 어두워 기업들은 나날이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로 인한 60 세 정년보장 정책 등으로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저는 그저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늘려주길 기다리는 것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말로 청년들은 새마을 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 의 정신을 본받아 진취적인 자세로 벤처 창업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 년대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에 '창의'와 '창조'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글로벌화되었고 세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뒤처지지 않고 앞장서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 취직이 늦은 나이까지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창업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쉽사리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이 좀더 쉽게 자신의 꿈을 펼치고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현재의 대출방식의 창업자금 지원이 아닌 철저한 사업계획서의 검토 아래 사업성 평가 후 투자형식의 창업자금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과 주위의 시선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리스크 테이킹' 정신이 부족합니다.

저성장의 영향으로 취업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농촌마을을 새마을로 바꾸었던 것처럼 도전정신을 가지고 첨단 기술 분야의 창업에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저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20 대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새마을 운동에서 찾는다면 바로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일 것입니다. 거기에 '창의'적이고 '창조'인 20 대만의 생각과 열정을 더해 청년들의 주도 아래 벤처 창업이 활성화된다면 청년실업문제의 완화 및 국가경제발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⑩ 용지수(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일제 36 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 세기 내에 저개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경제는 선진국진입을 목전에 두고 성장 동력과 활력을 잃은 채 10 년 이상 주춤거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은 창립 10 주년을 맞아 '故 芝巖 선생의 비전과 유산 -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세대 간 공유'라는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이룩한 정책들에 대한 비전과 유산에 대해 평가해보고, 앞으로 남아있는 선진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훈을 얻고자한 것입니다.

발표자 안병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날 한국의 경제발전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후발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하기 전에 선진 각국들은 길게는 400 년 전부터 경제발전을 해오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도성장입니다. 한국은 인류사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오픈 시스템'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양상은 내륙에서의 발전이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패턴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 내륙으로 들어와 도시, 농촌으로 역류를 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선진 자본주의를 구축한 국가에서 400 년 간 축적한 노하우, 기술, 자본 등이 한국이라는 저개발국을 향하여 썰물처럼 들어온 것입니다. 때문에 각 국내의 경제 성장 요인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더라도, 폭발적으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자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이 자원빈국으로서 대외적으로 자원 부국들과의 끊임없는 국제적 교류를 계속해 옴으로써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는 지난날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닥쳐오는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해왔다면서, 한국경제가 걸어온 길은 세계 곳곳의 개발도상국에 경고적 의의를 띄고, 이제는 과거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것만큼 개발도상국에 알려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권혁찬 학생은 과거 우리나라가 월남파병, 독일 광부 파견 등으로 수출, 해외 진출, 물류통계에 대해 배우고 국제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맞은 경제 위기는 정부, 기업, 민간이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향후 발전 방향은 위 세 명의 발제자가 말한 한국의 과거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성공요인은 '국제화'였습니다. 국내 성장 요인이 고갈됐으므로 세계 각국과 교류하며 외부에서 경제 성장 요인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경제 위기 또한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픈 시스템을 구축해 극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FDI 란 넓은 의미에서 인수합병, 새로운 생산시설 건설, 해외 영업활동과 사내 론으로부터 파생된 수익의 재투자를,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새로운 생산시설의 건설을 의미합니다.

즉, 투자자가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익에 큰 도움이 되겠죠.

둘째, FTA 를 통한 무역 확대로 글로벌 무역 거래 간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 또한 한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다른 나라들과 FTA 를 맺는 현실에서 우리만 제외된다면 한국의 무역환경은 급속히 악화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시장 규모가 크고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들과 FTA 를 맺어 우리의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픈 시스템 하에 정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경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과 FTA 를 체결하면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있지만, 피해 부문을 어떻게 보상하고 경쟁력을 높여주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은 우리의 장기적인 진로를 이해하고 정부와 같이 협의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전반에 만연한 경제에 무관심한 태도를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영토를 넓혀 외부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오픈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국민, 기업 등이 제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한다면 한국은 다시 한 번 빛나는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⑪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한국선진화포럼의 창립 10주년 행사와 월례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신문을 경제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저성장과 청년 실업입니다. 기업들은 많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만 두고 있고 정부는 투자하라고 윽박지르고 있고 성장은 저속화되고 실업률은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속성장을 했는데 거기서 해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에 맞춰 한국선진화포럼이 창립 10 주년을 맞아 지난 10 년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열린 월례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성공신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며 중요한 사건을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중 선택된 주제는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었고 이에 대해 한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와 진념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저희 NGL 학우 3 명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한승희 교수는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출중심의 불균형 성장모형을 채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 내에 소기의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이나 위생, 주택 등의 사회부문에 있어서는 정책적 관심의 지속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각 지표들의 목표치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계획의 집행 능력이 우수했고 내외 경제 환경이나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범국민적 발전 역량의 결집과 리더십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경한 학생은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부작용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행동력의 차이도 있지만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달라졌기에 그때의 방법이 지금과 부적합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시대의 변화를 잘 읽었습니다. 60 년대 노동집약적 산업화에서 70 년대 중화학 공업의 육성 그리고 80 년대 강도 높은 개방과 안정화 정책의 추진은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시기적절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학습과정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여론 수렴과 참여 절차의 개방과 투명성이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에너지와 열정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말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왜 기업은 유보금을 쌓아만 둘까요? 그것은 미래가 갈수록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시기적절한 정책을 통해 그들을 안심시켜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면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예측을 하기에는 조사가 미흡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무리하자면,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은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 전 국민과 이를 앞에서 이끌어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리더들 마지막으로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 시기적절한 정책을 편 우리 정부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고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나 이는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풀어갈 문제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랬다면 지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못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과거를 되새겨보고 거기서 뭔가를 배운다면 다시 한 번 도약하며 진짜 선진 경제를 창조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⑫ 조준상(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좀처럼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내수 부진에다가 최근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까지 겹치자 올해 3 분기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의 경제성장 감소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한국이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는 또 한 번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선진화포럼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렸다.

이에 故 芝巖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위시한 지식인들이 선진한국 미래사회를 위해 설립한 지 올해로 10 주년을 맞은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위기 극복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난 9 월 1 일, 창립 10 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제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제로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 좌장을 맡고, 안병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와 발제를 한 가운데,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권혁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학생과의 의견 교류 및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주제 발표와 발제를 맡은 안병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20 세기 후반의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북한과 비교하여 한국이 고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주노선이 아닌 국제협력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한국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무역, 해외저축, 기술도입을 꼽았습니다.

이에 토론자로 참여한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위의 세 가지 경제성장 요인에 동의하면서 이에 더하여 인적자본과 높은 교육열, 제도적 유연성과 응세능력, 지도층의 추진력이 뒷받침되었기에 한국이 선진국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토론자로 참여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혁찬 학생은 한국의 과거 눈부신 경제성장이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3 대 주체인 정부, 기업, 개인(가계)이 서로 하나가 되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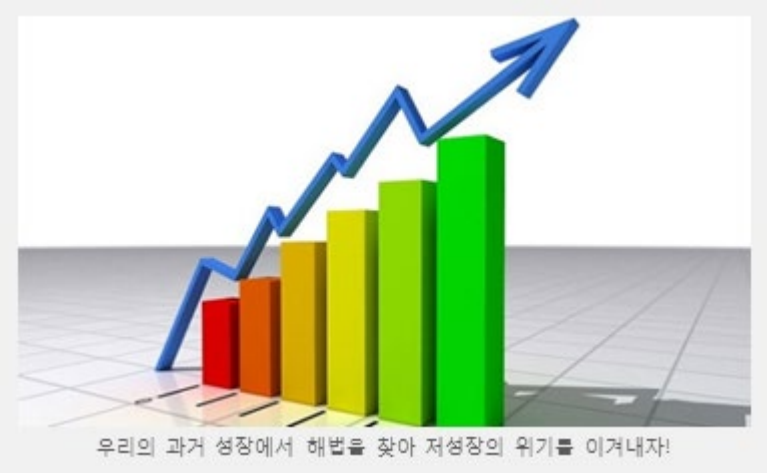
정부, 기업, 개인의 입장에서 각각 변화된 자세가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의 선배 세대들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적을 물려받은 우리는 현재 또 한 번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선배 세대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정부 주도의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구조로 경제정책 또한 추진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야 간에 단기적인 이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여 국가를 위한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과거와 같은 도전적인 투자 정신이 요구됩니다. 최근 기업들은 기업 내 유보 자금을 그대로 쌓아놓은 채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투자는 앞으로는 일본, 뒤로는 중국 사이에 끼여 현재 우리의 기존의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투자 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입장에서 크고 작은 사회적 갈등을 접어 두고 함께 나아가는 화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대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등의 여러 가지 갈등이 혼재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소모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화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과거 성장에서 해법을 찾아 저성장의 위기를 이겨내자!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현재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까지 발전한 한국. 한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지 혹은 주저앉고 말 것인지 하는 경제성장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선배세대들은 국가 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정부, 기업, 개인이 하나 되는 마음가짐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저성장 위기를 딛고 선진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해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과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⑬ 최민경(고려대학교 정경학부)



원조 하는 나라가 된 한국, 그 비결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한 대표적인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명 '압축성장'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성과를 낸 데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은 저출산, 사회갈등, 청년실업,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과거 선배들이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야 했던 것처럼, 지금 세대들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그 해결방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과거 대한민국의 성장 신화에 그 해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선진화 포럼 10 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특히 1960 년대 초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에 대한 의미와 평가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한국사를 배우면서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긴 역사의 일부분으로서만 다루다 보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한승희 초빙교수님께서는 경제개발 5 개년의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961~1963 년 제 1 공화국의 경제개발 3 개년 계획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위 계획에서는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발전시키고, 사회의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주된 정책이었습니다.

그 후 1962~1966 까지의 제 2 공화국의 제 1 차 5 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는 공업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에너지 공급 증가, 기초산업 시설 확충 등의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교과서에서 많이 접하는 1962~1966 년 제 3 공화국의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에서는 역시 자립적인 경제 환경을 위하여 전력, 석탄 등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수출과 공업화를 목표로!

또, 추가된 점으로는 수출 진흥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을 이루었고, 그동안 관심 밖이었던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시도되었습니다. 이는 후에 1982~1986 년까지의 5 차 계획의 명칭이 경제'사회'발전 5 개년 계획으로 바뀐 것과도 관련이 있죠.

한승희 교수님께서는 또, 한국의 경제 개발의 성공 요소를 네 가지 사항들로 꼽으셨는데, 첫째는 최고 통치자의 의지, 둘째는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입니다. 당시 국민들 간에 빈곤 상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와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어있었다는 것이죠. 셋째는 KDI 와 같은 싱크탱크가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많이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개입의 목적이 가격기구의 작동을 중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했다는 판단이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분명 많은 발전을 이루어 냈지만,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마냥 찬사를 받기는 힘든 이유는 사회적으로 고려하지 못 했던 측면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개별 제품의 가격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빈부격차,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지 못한 점 등이 그 한계입니다.

이에 대해 진념 전 경제부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추진력과 민첩성이 뛰어났음을 얘기 하시면서 지도자의 뛰어난 리더십에도 그 공을 돌리셨습니다. 또,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이경한 학생도 경제 개발 5 개년의 탁월함을 얘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 놀라운 성장을 이룬 국가임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기가 침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정책으로서 보이고 기업이 이에 반응한다면,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에도 건강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선진화 포럼 10 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⑭ 최현수(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국제협력노선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9 월 1 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故 芝巖 선생의 비전과 유산 -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세대 간 공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이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안병직 서울대명예교수는 "경제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경제 발전"을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이러한 엄청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첫 번째로 무역, 두 번째로 해외저축, 세 번째로 기술도입을 꼽았습니다.

또한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하면서, 국제협력노선을 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OECD 의 한 국가로서 성장해나가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러한 3 가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이외에 인적자본과 높은 교육열, 제도적 유연성과 응세능력, 지도층의 추진력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건국대학교 권혁찬 학생은 경제발전을 개인적 측면, 기업적 측면, 정부적 측면 세 가지를 들며 1960 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찬란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하였습니다.



인적자원, 교육열이 경제발전의 하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었습니다. 또한 국토가 양분되고 항상 전쟁의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발전하였고,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경제 상황과 국내외 상황이 있었겠지만 한국경제발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적자본과 높은 교육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국내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울 시기에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CAN-DO Spirit”, “잘 살아보세”정신이 점점 퍼졌습니다.

또한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지각하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처럼 매우 어렵고 가난함에도 교육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다른 여러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점차 이러한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사라지고 있으며 교육열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입시위주, 줄세우기식의 암기위주의 교육이 계속되면서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가진 인재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교육이 아닌 실천적, 창의적 교육이 필요하다.

올바른 교육은 대외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기반일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성과 인간성을 함께 함양할 수 있고, 사회적 실천을 중요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실천을 중요시하는 교육, 열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입시제도가 대학 위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줄 세워 평가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위주로 다양하고 창의적 인재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중심, 대학 위주의 학생 선발은 능력의 다양화, 인성, 창의력 교육 등 주입식 교육이 아닌 다방면의 인재와 교육을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력 교육, 경제, 정치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이 확대되고,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는 현 지구촌 상황에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벤처 창업 또한 추구되는 올바른 경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입식 암기 교육을 버리고 실천적 인성교육과 창의성과 사고력을 함양하는 교육, 다양화된 교육을 대학 중심의 입시 제도를 통해 진한다면 벤처창업, 경제발전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 번 이룩하고, 선진경제창조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⑮ 김수빈(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KDI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 >

(단위: %, %p)

	실질GDP (1+2+3)	취업자 수 (1)	물적자본 (2)	총요소생산성 (3)
2001~2005년	4.6	0.9	2.1	1.5
2006~2010년	4.0	0.5	1.8	1.7
2011~2015년	3.1	1.0	1.3	0.8
2016~2020년	3.0	0.4	1.0	1.6
2021~2025년	2.5	0.1	1.0	1.4
2026~2030년	1.8	-0.2	0.8	1.3
2031~2035년	1.4	-0.4	0.5	1.3

주: 1) 실질GDP 증가율은 5년 기간의 단순평균이므로, 로그차분으로 측정된 요인별 기여도의 합과 조금 다를 수 있음.
2) 2014년까지 결과는 실적치에 기반한 성장회계 결과임.

자료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20 세기 세계의 어떤 국가보다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표현합니다. 낮은 노동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과거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KDI 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 년 후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1일, (재) 한국선진화포럼 10주년 기념 토론회(출처:뉴데일리)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성공의 요인을 되짚어보고, 오늘날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재) 한국선진화포럼은 9 월 1 일 개최한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세대 간 공유'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발전의 성공요인으로 무역, 해외저축, 기술도입을 꼽았습니다. 당시 개발도상국들은 국제협력노선 또는 자주노선을 선택하였으나, 세계와 협력하고 수출주도형 전략을 내세운 우리나라는 결국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토론자 이장희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인적자본과 제도적 유연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할 수 있다' 정신을 가진 국민과 우수한 제도가 결합하여 경제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토론자 권혁찬 학생은 개인과 기업, 정부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의 경제 위기에 주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는 개인을 통해서만, 정부를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기업, 정부가 협력해야만 온전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은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반감을 없애야 합니다. 반기업정서는 우리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칩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기업이 있다면 엄격히 감시하고, 대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장려함으로써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은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조건 일을 오래 한다고, 야근을 한다고 좋은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 시간을 중심으로 한 성과책정이 아닌 성과 중심의 임금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사과정을 개편해 무분별한 스펙 쌓기 경쟁을 줄여야 합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업무 능력이 아닌 '스펙을 위한 스펙'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이력서 내용이 많은 것보다는 실제 업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창조경제와 벤처사업 지원 등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유인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제발전은 어느 한 주체만 노력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 민관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듯, 오늘날의 경제위기도 모두가 협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⑯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20 세기에 36 년 간의 일제강점기와 3 년간의 6.25 전쟁이라는 큰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나라에 절망과 빈곤만을 남겼고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6.25 전쟁의 영웅 맥아더 장군이 우리나라가 복구되려면 100 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냄으로써 이 말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뤄낸 산업화를 우리는 반세기만에 해냈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서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의 발전을 교과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 위의 제조업 경쟁력, 세계 11 위의 경제력,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등을 가진 무시할 수 없는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했지만 우리처럼 부유해진 나라는 중동의 산유국들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경제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했고 왜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실패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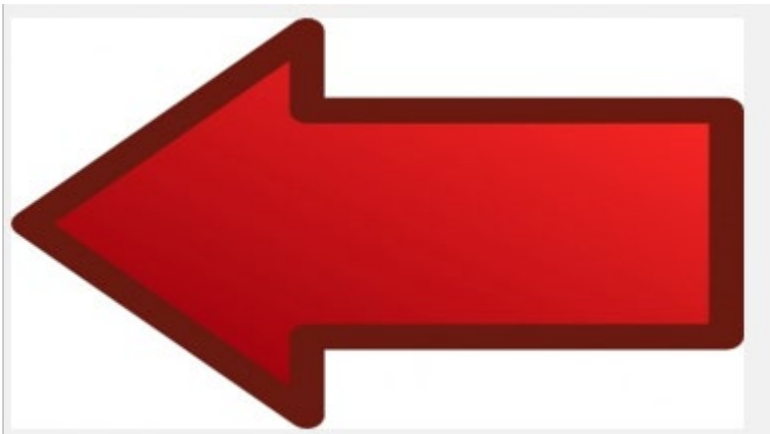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어떻게 기적이 가능했을까?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지도층의 추진력, 애국심, 높은 교육열 때문입니다. 지도층들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했으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지원들을 횡령하는 일 없이 국가를 일으키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국민들도 지도층들이 이렇게 국가를 위해 애쓰니 그들을 본받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국가정책들이 추진력 있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같은 큰 고난을 겪고 힘들게 지킨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는 애국심이 남달랐습니다.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나가고 베트남에 군인으로 나가고 중동에 건설하러 나가고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이분들의 땀과 피가 경제개발자금으로 사용되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교육열은 경제발전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신기술을 배워와서 국가를 위해 사용한 인재들 덕분에 지금의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반세기 동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도층들의 추진력은 점점 더 퇴보하여 식물국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으며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고 밑도 끝도 없이 욕하는 사람들만 지천에 널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손에 대지도 않는 사람이 된지 오래고 초, 중, 고, 대학생 모두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경험 공유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와 같은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를 일으킨 윗세대의 경험을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윗세대의 경험을 들으면 생각이 있는 젊은 세대들은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헬렌켈러, 에디슨 같은 외국 위인들의 위인전보다도 우리나라를 일으킨 산업화의 주인공들에 대한 책을 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 어릴 때부터 국가관, 애국심 등이 길러질 것입니다.

또 과거에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기업인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기업인들에게 너무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들은 과거와 달리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개발 5 개년 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시대에 세우고 그대로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많은 정보를 기업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와 정책계획집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신상필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받고 보상받아야 사람들이 열심히 할 의욕을 가집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국회의원들의 취업청탁, 뇌물수수부터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한 것들이 널렸습니다. 과거처럼 신상필벌대로 사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고 계속 퇴보한다면 한강의 기적이 과거의 좋았던 추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윗세대 분들이 이루어냈듯이 우리도 제 2 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킵시다.

⑰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부)



세계빈곤국가에 퍼져나가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

여러분들은 새마을 운동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새마을 운동은 한강의 기적과 더불어 한국경제발전의 백미를 이루는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자립마을의 비율이 98%까지 올라갔고 농촌의 가구당 수입은 2.5 배 이상 증가한 1970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촌사회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신상필벌(信賞必罰)'이었습니다. 성과가 있는 마을에 더 지원하고 성과 없는 마을에 지원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죠.

지금 저희 한국경제도 새마을 운동 전의 농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경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럴수록 과거를 돌아보고 저희 대한민국의 농촌이 한꺼번에 성장을 이루었던 신상필벌의 원리를 떠올려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할 때입니다.

현 시점에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개혁 중 하나가 바로 경제를 살리는 '노동개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꼽고 청년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성과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지요.

노동시장의 변화는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꺼내줄 열쇠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 국내 노동시장의 실태는 한국경제를 침체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노동시장은 힘이 강력한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고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지나쳐 세계에서 순위 안에 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유연화된 노동시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침체된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FDI 유치에 큰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가들이 지적한 한국 FDI 유입의 감소원인은 '강성노조'와 '경직된 노동시장'이었습니다. 이렇듯 연쇄적으로 노동시장의 문제가 경제전체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노동시장의 답은 '생산성 확대'입니다. 근본적으로 계속 이윤이 증가하면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새로운 근로자들, 즉 청년을 계속 고용할 여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개혁의 중점은 '생산성 확대'여야 하며 이것이 새마을 운동 당시 생산성을 극대화시켰던 '신상필벌'의 원리를 떠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새마을 운동 당시 농민들의 의식을 선진화시켰던 만큼 노동개혁에서도 신상필벌의 원리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의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수정이 제도 자체의 수정에 머무르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익에 반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성과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필자는 구체적으로 세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에 이중시급제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내면 시급을 일정임금의 1.5 배를 지급하고 성과가 저조하면 일정임금의 0.8 배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받는 시급이기 때문에 몇 시간, 시간을 버티자'는 느낌이 아니라 '기왕 일하는 거 더 성과를 내서 더 받자'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부터 성과제에 익숙해진다면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성과제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좀 더 융통적인 성과제가 필요합니다. 하루 일당량을 정해놓고 그 일이 끝나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늦은 귀가를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른 퇴근이 일종의 '상'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달 후 통장에 찍히는 월급인상보다는 당장 오늘의 이른 퇴근과 휴식이 더욱 효과적인 성과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도 적극적인 아웃(OUT)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해고되지 않아 방만한 운영, 무사안일주의와 책임감이 결여된 근무실태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공무원도 아웃(OUT)시킬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면 이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성과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듯 새마을운동의 교훈을 지금 세대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심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원리를 노동시장에 적용시켜 한국경제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의 발전을 이뤘던 경험이 있기에 앞으로도 선진화된 경제강국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림 1) https://www.youtube.com/watch?v=gwSctnZsx2w
그림 2) https://www.youtube.com/watch?v=drpyUN5f8h4

⑱ 정우재(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인적 자본에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뜨겁다 못해 과열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 없이 그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성숙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교육열은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 비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한국의 교육열을 거론하며 인적자본이 우수한 국가라 극찬했습니다.

석유를 비롯하여 어떤 자원도 나지 않는 자원빈국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인적자본의 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알고 부족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국민을 교육한 선대 지도자의 혜안 때문입니다.

식민시기와 한국전쟁 후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제 2 차대전 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국가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이처럼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유례가 없는 한국의 고도 성장은 인적자본과 교육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숙되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OECD 에 가입했다', '세계 10 위권의 경제대국이다'고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패를 비롯해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식 수준이 선진국인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경제)는 발전했지만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시민 의식은 성장하지 못 했습니다. 즉, 선진국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 인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진보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경제 역시 세계경제 둔화, 저성장과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본의 부활과 중국의 부상 등 여러 가지로 힘겨운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시민 의식이 성숙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경제 발전도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발전과 진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한 통일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의 성장 담보일뿐만 아니라 국가적 업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통일이 무슨 대수냐고 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일이 국가적 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방안이 통일이 되었든, 아니든 간에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숙했다면 누군가 화두를 던지기 전에 이것이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국가적 목표가 될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구호를 던져도 그때만 '와~'하고 일어날 뿐 금세 잊혀집니다.



통일한국,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따라서 한국이 질적 측면에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즉 의식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의식의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제성장 역시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 남미와 한국의 차이입니다. 이들 나라는 경제적 가난으로 인해 정치적 안정조차 이루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미 한국이 극복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착해야 할 지점은 허울 좋은 선진국 타이틀이 아니라 성숙한 의식까지 뒷받침된 진정한 의미의 선진 국가입니다.

누군가는 100 년, 200 년에 거쳐 지금의 선진국이 된 만큼 우리의 의식 수준 역시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성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의식 수준을 성숙시키는 것은 경제성장과는 달리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처럼 뚝딱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넋놓고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정치인, 관료와 같은 국민의 대리인과 나라의 일꾼과 지도자들부터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 공동체가 잘 되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선, 청렴결백한 윤리관을 갖춰 부패를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같이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면 누구라 하더라도 법치로 엄히 다스려 청렴결백한 질서를 형성하고 이를 몸에 체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도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과거 1950 년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많은 나라 중 한국만 유독 이토록 발전하게 된 것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제도의 역할이 큽니다. 바로 위에 위치한 북한과 비교해봐도 제도의 힘은 명백합니다. 신체도, 머리도, 성격도 비슷했을 한 무리의 인간들이, 한 민족이 제도에 의해 지금의 차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 개인의 일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및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연봉 1 억이 넘는 귀족 노조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임금을 올려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려 정신이 필수입니다.

토론문화 활성화를 통해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사회 갈등은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이 다른 것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데서 출발하고 격화되는 것입니다.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법,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병역 비리, 뇌물 비리 등 뉴스와 신문만 보면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고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다시 추락할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지금만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섰을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권새암(서울대 경제 1) : 안녕하십니까,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두는 한국의 농업에 대해서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한국은 전국토의 67%가 산지이고, 땅이 비옥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농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땅은 매우 비좁은데, 인구는 많아서, 농업만으로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 농업보다는 중화학 공업과 첨단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발전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농업문제를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농업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식량 안보라는 화제도 있고, 농업이 타 산업과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있기에 농촌의 발전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1960 년 대에는 한국의 농촌이 크게 낙후되어 있어, 절망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저조한 환경 속에서 체념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 년 대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의 현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농촌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can-do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농촌은 가난에서 벗어나 크게 발전하여 현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원동력은 마을 간 경쟁, 신상필벌이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낸 쪽은 보상을 얻었고 이 덕분에 모두가 열심히 하여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농촌의 현대화를 이뤄냈지만 현재 한국의 농업은 글로벌 비교우위가 없어서,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 때문에, FTA 체결을 통한 농산물 개방이 농민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와 FTA 시행에 있어 많은 논란, 착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FTA 는 거시적으로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거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FTA 가 체결된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특히 다른 국가의 농업과 경쟁하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지난 새마을 운동 때처럼 경쟁력을 높여 농업 발전을 이룰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의 주제는 '경쟁을 통한 한국 농업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서울대 화생공 2) : 일단 FTA 체결로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국내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불이익,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되었다는 점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가야합니다. 즉, 국내 농업 생산자들은 매우 많은 수의 외국 생산자들과 경쟁하게 되었죠. 특히 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넓은 토지, 싼 임금을 통해 생산하는 농산물들, 예를 들어 쌀, 콩, 옥수수 등들은 한국의 국내 농산물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를 시장을 닫는다든가, 가격, 수입량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이기게 만들면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이 완전히 비교우위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만의 특산물이 분명히 존재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국산이 입맛에 더 맞는, 경쟁력 있는 특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한국 농산물의 품종을 더욱 개량하거나, 온실, 기계화를 지원한다면 분명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태을(서울대 경제 2) : 네덜란드 농업의 사례를 인용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농업 세계 2 위의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땅이 매우 큰 국가는 아닙니다. 경지면적은 남한 면적의 40%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농업 국가인 이유는 먼저 적절히 규모화되어있고, 농가 평균 경지 면적은 호당 20ha 로, 한국의 15 배입니다. 생산성은 EU 평균의 4.5 배로 매우 높습니다. 규모화된 경영은 자동화, 기계화를 수월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의 경쟁력은 기본적인 농업 생산, 식품 가공 기술, 생명공학, 물류 및 농업 연구 분야의 뛰어난 역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농토가 부족해도 엄청난 농업 생산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화, 생명공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과의 경쟁을 통해 제도, 농업 방식 등 배울 점은 배우고, 신기술, 새로운 정보를 교류하면서 농업 분야의 발전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쇄된 상태에서는 어떤 전환점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한국의 특산물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농촌 소득도 증가하고, 개방 상태에서도 식량 자급률이 늘어날 것입니다. 네덜란드보다는 못해도 꽤나 뛰어난 농업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승모(서울대 수의예과 1) : 이 네덜란드 사례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도 될까요? 일단 잠시 먼저 한국 농업 발전 계획에서 살짝 문제점을 짚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농업 발전에서 계속 소득증대와 복지정책 중점 추진, 유통개선, 친환경 농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간에 실천하기 힘들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농업 선진국을 좀 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보면 먼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네덜란드는 다른 작물을 기를 수 없는 간척지를, 목축업의 기반으로 삼아 우유와 치즈 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1 위 낙농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영역을 늘려야 합니다. 농업 선진국들의 농업 영역은 식량이나 가축사료를 넘어 기능성 식품, 의약제품, 첨단 신소재 등으로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콩 단백질이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제품, 친환경 옥수수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 첨단 농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도 '먹는 농업'에서 벗어나 보는 농업, 관광·의료·생명·신소재 농업으로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자꾸 전통적인 농업 관점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승호(서울대 기계항공 1) : 유럽에서 아시아의 농산물에 관심을 갖는 젊은 사람들이 꽤 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의외로 농산물 개방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감귤, 단감 수출 세계 1 위 이스라엘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 많은데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농업 수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본, 기술 집약적인 농업, 수출 지향적 농업을 통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사막의 농지화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였고, 농기계, 전자장비를 개발, 보급하여 이 농업기술만으로도 매년 10 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합니다.

수출전문조직 Agrexco 를 운영하여, 잉여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농산물을 수출하여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 척박한 이스라엘이 농업 부문에서 성공을 이루었는데, 한국이라고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다고, 무조건 피해만 입고 농업이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만은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보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새암(서울대 경제 1) : 네,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 잘 들었습니다. FTA 가 활발히 체결되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업 부문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오늘 제시해주신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쟁력을 강화할 길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연구 기관과의 연계를 잘 이루면 농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자가 소비자와 잘 연결되어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품 작물에 특화할 수 있다면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면서 한국 농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약하고, 연구를 잘 진행하면, 한국이 유리한 농산물이 수출되는 결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생산성 향상으로 식량 안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개방과 시장경제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잘 해낸다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나종문 (고려대 미디어):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내수 시장 부진과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려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과거 고성장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경제가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준호 (고려대 미디어): 우선, 지금의 우리나라는 협력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계, 기업, 정부가 하나로 뭉쳐 경제발전에 임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했으며, 가계와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도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경제발전의 성공신화를 이루어낸 것과 달리, 지금의 기업들은 구조조정만 반복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만들었던 규제로 인해 지금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가계는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갑질'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기업들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한국 사회는 가계, 기업, 정부가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 주체들이 하나도 동참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의 한국경제는 시너지 효과를 낳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 동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단순 구조조정이 아니라 창의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계와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모양새가 다시 한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양새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 아니라 창의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투자 관련 법안을 내놓는 방식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유민 (고려대 미디어):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기업들의 경제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활동을 하려면 먼저 정부 규제부터 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한류 열풍이 불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복잡한 온라인 결제시스템에 막혀 구매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핀테크 시장 역시, 세계에서는 이미 개발이 끝나고 상용화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금융 규제에 막혀 제대로된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기업의 기업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했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즉각즉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원 (고려대 미디어): 저도 전유민 학우와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는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국회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야 갈등으로 인해서 입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국회 선진화법'이 어느 정도 입법 부재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새로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6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여야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안 상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야 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새롭게 나오는 법안 자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정부 지침을 통해 법의 기능을 대신하는 등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경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거나,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통과되는 등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을 폐지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또 다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 수뇌부의 권한을 줄여 여야갈등을 줄이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종문 (고려대 미디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야 하다는 의견과, 지금의 국회 선진화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학우 분들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용 (고려대 미디어): 저는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연 청년 실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성장 원동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는 우선 한정된 국내의 좋은 일자리들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러한 일자리들에 취직하기 위해 몰리면서, 유례가 없던 일자리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대기업은 뽑을 사람이 넘쳐나는데, 중소기업은 인재가 없어서 인재난에 허덕이는 이상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보수가 더 높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인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안정적이지는 못한 직장이지만, 자신이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경우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로 하지만, 경력사원의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경험만 있다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취업 불균형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경력 사원을 우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 사원을 우대하는 정책을 세운다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일 필요가 없고, 대기업은 좋은 인재를 얻을 수 있으므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건 (고려대 미디어): 저는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를 만들어낸 기업 창업주들의 일화나, 세계에 성공한 CEO 들의 일화들은 하나 둘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는 주커버그처럼 젊은 창업자들의 성공들이 눈에 띄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창업 관련 성공담을 접하기 힘듭니다. 특히 젊은 창업자들의 성공담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청년들은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창업 역시 성장 가능성이 큰 혁신형 창업보다는 당장 밥벌이에 급급한 생계형 창업이 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성장한 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신기술과 신사업을 바탕으로 한 혁신형 창업의 기업은 네이버나 넥슨, NC 정도를 제외하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때문에, 저는 청년층이 취업 준비에만 몰두하는 것보다는 창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혁신적인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업이 많이 세워진다든가, 이스라엘처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창업을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윤 (고려대 미디어): 저도 임건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실패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실패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디어로만 판단하는 미국의 창업 문화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실패자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추후에 다시 취업을 할 때는 이미 나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추후 심사를 통해 또 한번 기회를 주는 정책이나, 창업에 실패하고 취업 쪽으로 방향을 돌리더라도 오히려 창업을 도전했다는 경력 자체를 우대하게 하는 정책과 같은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교 (고려대 미디어): 민경윤 학우의 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이유는 임건 학우나 정기용 학우의 말처럼 청년들의 도전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직업만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사회 현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창업에 뛰어들었으면 정부는 이미 창업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비중이 현저히 적고,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려는 방향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정부가 창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늦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을 권장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창업에 대해 제대로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창업을 권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도전의식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종문 (고려대 미디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먼저 이것에 대해 의구심부터 들면서 도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듭니다. 저부터 도전 정신이 사라진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도전 정신을 높이 다루고, 오히려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의 고성장 사례를 통해, 지금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았습니다. 학우분들 모두가 참신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은 다시 한번 화합하여 하나로 뭉쳐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국회는 여야 간 소모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본연의 법안 제정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취업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실패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창업 문화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역시 도전을 하지 않음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선진 국가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참석해주신 학우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등한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 성찰

최민경 (고려대학교 정경학부 1) : 안녕하세요, 우선 토의에 참여해주신 학우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사회갈등, 청년실업, 저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에 희망이 없다는 비관적인 의견들이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한때 원조 받던 나라에서 현재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낸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에서

그 지혜를 얻어,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현실과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의 성공 요소 중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했다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 계획은 박정희 정권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형태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문화에 영향을 끼쳐 한국이 경제 전반적으로 활발해지는 결과를 만들었죠. 저는 과거에서 그 지혜를 얻어 국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새로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여 소비자들의 소비 범위를 더 넓히고, 해외 무대에도 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준 (고려대학교 정경학부 1) : 일부 동의합니다. 먼저,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출 지향적인 공업화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투자와 보호 속에서 삼성, 엘지,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현재에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로 우뚝 선 위 기업들의 신화를 또 한번 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 과거의 성공만으로 유지하기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들에게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업 양성에 대해 단순히 투자를 늘리기 보다는 그 비용이 제 곳에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는 전략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연정 (고려대학교 정경학부 1) : 사회자분께서 또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시장을 활성화시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의 성과에 주목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너무 약한 점도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쓸 돈이 별로 없죠. 가장 간단한 지표 2 가지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는 바로 내수의 규모와 가계부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의 요인으로는 수출의 부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내수, 특히 민간 소비의 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들을 사람들이 사지 않으니 당연히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겠지요. 또 가계부채 또한 이미 1000 조를 넘어선 상태이고 점점 그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먼저 타개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경제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재분배 제도를 재정비하고 기업의 법인세 인상이나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연 (고려대학교 정경학부 1) : 허준 학우와 채연정 학우의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너무 성장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 우리가 못 알아보고 지나친 가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에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많은 특혜를 받고, 특히 대기업의 오너(owner)들은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을 몸소 일구어낸 노동자들의 경우 그들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장에게 맡기기보다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혜택과 감시, 그리고 적절한 직업 환경이 마련되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준영 (고려대학교 정경학부 1) : 박승연 학우의 말에 이어 저도 노동력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한승희 교수님께서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이 5 개년 계획의 성공 요인 중 하나라고 하신 것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 한국에서, 재능 있는 외국인들을 충분히 유치하여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외로 빠져나가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혜택을 주는 직업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경 (고려대학교 정경학부 1) : 학우 여러분들의 유익한 논평 감사했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는 무엇이며, 과거에서 그 지혜를 얻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학우분들은 과거 수출을 활발히 하여 한국 기업들을 대거 성장시킨 것처럼,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발전 격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단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소득재분배 제도를 통해 과거에는 놓치고 지나쳤던 소득 불평등 문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법인세 인상이나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거 양질의 노동력이 성공 신화를 이루는 데 이바지했던 것처럼 젊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출산과 양질의 노동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 토의에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가릴 것은 가리고, 배울 것은 배우며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③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경제 성장을 위해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공수진(광운대 행정 2): 지금부터 광운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연구모임에 참가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룩한 것은 정부가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 데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개발 의지를 효율적으로 집약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경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성공 요인을 어떻게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혜림(행정 2): 70 년대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을 육성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에 큰 투자를 한 것이 발전에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현재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0 년대에는 한국이 주력 사업을 확보하고 발전시키는데 집중했다면 현재는 발전된 사업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동반성장위 등 중소, 중견기업들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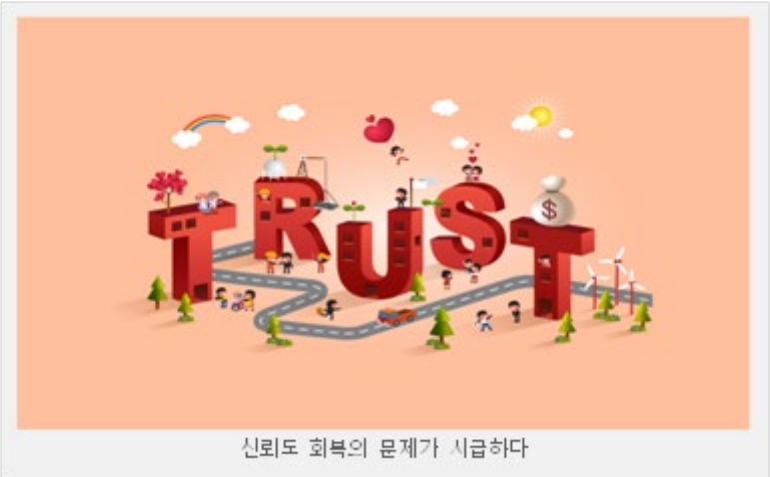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진선영(행정 2): 저도 경제 개발을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정부, 사람들 간에 신뢰도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에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규모, 작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국민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정책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시행한다면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5 개년 경제계획 같은 장기 계획을 홍보하기보다 이를 시행하는 소규모 정책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보다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을 것입니다.



신뢰도 회복의 문제가 시급하다

조영신(행정 2): 중소기업 진흥, 신뢰도 회복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뢰도 회복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투명한 의정 활동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국회의원 뇌물 수수 사건이 큰 사건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의 비리에 무뎌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건으로 신뢰도를 잃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게 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불신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며 또한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에 어두운 부분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박지혜(행정 2): 많은 분들이 신뢰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시군요. 저는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의 성공 요인이 정부의 탄력적인 운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0 년대의 상황에 맞는 대처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정부는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와 함께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의 경제 개발 전략 성과를 더한다면 최적의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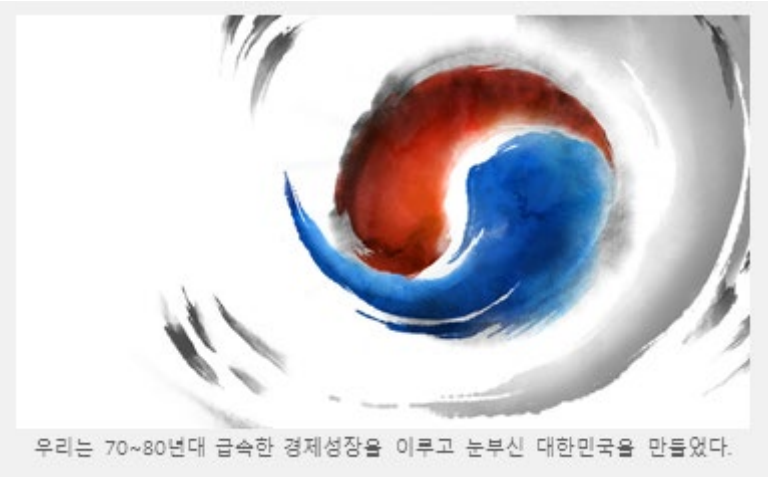
이의영(행정 2):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큰 이슈 중 하나는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를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는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으로 개입하여야 하지만 복지, 공공성을 지닌 대규모 사업 등을 위해서는 끊임 없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민간 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정부가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공수진(행정 2): 네, 감사합니다. 광운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성공 요인을 어떻게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신뢰도 제고 방안,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④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권혁찬(건국대 경제 3)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기적같은 고속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한 각종 경제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중(상명대 경영 1) : 과거 대한민국 고속성장은 온 국민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주요한 요인은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근대화와 민주화에 대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현(신한대 경영 1) : 물론 온 국민이 노력했던 것은 맞지만 과거 성장과정에서는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뿐 아니라 국방, 기초과학,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안을 발휘한 지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방식에 있어서 많은 이견도 있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만 그로 인한 대한민국의 고속성장과 그 과실을 현 세대가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가깝던 당시의 헌법을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헌법으로 탈바꿈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정부분 해소했다는 점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밝혀진 70 년대 전면전의 위기가 무사히 넘어갔던 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이뤄낸 가장 큰 성과이자 결실일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70 년대 초반부터 급격한 성장을 시작하며 북한을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북한에 의해 또 다시 한국전쟁과 같은 큰 위기를 맞이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본받아 눈부신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자

권혁찬(건국대 경제 3) :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수출과 내수 양쪽의 부진이 심각하고 정부나 가계, 기업 너나 할것 없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정윤(중앙대 경제 4)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 국가채무가 GDP 의 40%를 넘어갔다는 소식이 얼마 전 크게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비록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부채를 지녔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게 되면 심각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계부채 역시 심각합니다. 수출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입이 줄면서 흑자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무모해 보였음에도 기업가 정신과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사업을 일구고 투자했던 기업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최근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여 기업의 투자를 강제로 늘리려고 하고 정부의 압력에 마지못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한 정부나 기업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구(건국대 경제 3) : 적극적인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악성 규제는 확실하고 과감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특히 핀테크나 ICT 산업, 서비스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성장을 통해 분배구조까지 개선하는 기적적인 일을 이루어냈다.

권혁찬(건국대 경제 3)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거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던 요인들에 대해 여러분들의 평론을 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과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의 불꽃을 되살리는 일에도 우리가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 하며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⑤ 건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농촌 마을을 일으켰던 새마을 운동

김다솜(건양대 국방공무원 2) : 지금부터 건양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4%에서 2.7%로 0.7%포인트 낮췄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희망을 잃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은 '새마을 운동의 자조정신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새마을 운동이 가진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에는 당시 경제정책에 따라 공업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나가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업지역이나 도심외곽지역까지 함께 잘 살아보자라는 의미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 자조정신을 심어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현 시기에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대에 들어 제 3 차산업에 밀려 점점 등한시되고 있는 1 차산업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의 농업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주(건양대 경찰행정 2) : 공감합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청년회의 평균나이가 49 세라고 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농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시에 몰려 취업난이 심화되고 반대로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한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농촌지역에 다시 노동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에게 농촌과 많이 접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에만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 청년들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 사라져가고 있는 농활문화를 되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현주(건양대 국방공무원 2) : 하지만 한편으로는 농촌마을 스스로 잘해보자라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자조정신을 가지게끔 정책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2014 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콘테스트는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조장하고 주민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도록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국소희(건양대 경찰행정 2) :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계속 경제 저성장의 늪에 머무르는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마을 운동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을 자조하는 마을만 지원한 관치차별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각마을이 자기부담을 조금이나마 지게 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청년실업의 문제에 대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욱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을 지원할 때 신용등급 외에도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함께 평가하여 책임감을 갖고 진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강민주(건양대 경찰행정 2) : 요즘 대기업 입사보다도 공무원직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삶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의 보장 같은 삶의 질도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2163 시간으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청년들을 괴롭히는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비정규직이나 질이 안 좋은 일자리보다는 정규직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

강수연(건양대 국방공무원 2) : 저는 국소희 학우의 의견에 더해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청년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새마을 운동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각 지자체 단위로 국민들을 일심단결할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유현주(건양대 국방공무원 2) : 공감합니다. 현재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 새마을 운동센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각 나라에 새마을 리더 봉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때 봉사단으로 대학생들을 참가시킨다면 직접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은비(건양대 국방공무원 2) :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N 포세대로 대변됩니다.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힘들고 학자금의 빚에 시달리며 취업문이 작아지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캥거루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취업문제의 해결이 시급합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임금피크제보다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문제를 다룬 벨기에의 '로제타'라는 영화가 실제로 '로제타플랜'이라는 벨기에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연(건양대 경찰행정 2) : 저는 사회의 분위기나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초등학생때부터 아이의 적성을 찾아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교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 때 공부성적이 좋지 않아서 전문직으로 빠진다는 분위기를 타파해야 합니다.

김시윤(건양대 경찰행정 2) : 현대 우리 사회는 공동체 문화가 상실되고, 이웃 간의 교류가 감소하여 소외계층의 고립감이 증대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공동체 정신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0 년대의 새마을 정신이 근면, 자조, 협동이었다면 현대적 의미의 새마을 정신은 이에 더불어 협동, 봉사, 화합으로 즉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구현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단순한 주민 참여가 아닌 주민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새마을 정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구현

김다솜(건양대 국방공무원 2) : 네. 감사합니다. 건양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새마을 운동의 자조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농촌 중심 운동이었던 새마을 운동을 생각하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청년들의 시야를 넓혀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N 포 세대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청년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조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새마을 운동을 수입하는 해외에 새마을 리더 봉사단을 파견할 때 대학생들을 참가시킨다면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생각들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⑥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덕규 (경희대 프랑스어학 1) : 안녕하십니까? 모두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 월, 한국선진화포럼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경제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기반인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소통에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각 농촌의 경제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는데요, 농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원활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날 메르스 사태와 더불어 현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Tony Rahman (경희대 화학공학 1) :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인데, 이는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한 예로, 핸드폰 요금 약정제가 올해부터 외국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데 드는 행정 비용이 최근 2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모여 작은 포럼을 개최하는데요, 외국인이 살기 힘들어지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자녀는 한국에 데려오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박재웅 (경희대 국제학 3) : 어떤 국가에서든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살기 힘들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한국의 현실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닌가요? 나라마다 물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정책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점이기에,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Tony Rahman (경희대 화학공학 1) : 박재웅 씨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문제점은 외국인에 대한 정책 변화가 최근 들어 너무 어려운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피드백이 이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다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외국인, 내국인 모두와의 소통을 더 활성화해야 합니다.

유선영 (경희대 중국어학 2) : 소통의 문제가 크다는 데에 공감합니다. 최근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서 보듯이, 정부가 과연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지양해야 합니다.

박재웅 (경희대 국제학 3) : 또한 지금은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 몇 달 전 메르스 사태에 관하여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통 부족을 메르스 초기 대응의 실패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발생 병원을 공개하고 대응 방법 등을 전파했다면 확산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김덕규 (경희대 프랑스어학 1)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Tony Rahman (경희대 화학공학 1) : 정부가 주도적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후원과 우수한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정부 지원이라는 3 자의 연합이 빛을 발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성과가 좋은 지역의 경우,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등 각 지역에 대한 실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50 만 명, 외국인 수는 작년 155 만 명을 넘었습니다. 외국인의 숫자가 이렇게 적지 않음을 한국 정부도 인지하고. 우리 삶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포럼이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발한 소통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길: Listen, Understand, Act

유선영 (경희대 중국어학 2) : Tony Rahman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운동은 지역 주민의 실태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을의 대표가 존재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역 정부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앙 정부와 국민/외국인과의 소통을 개선하는 데에는 지역 정부와의 소통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재웅 (경희대 국제학 3) : 동의합니다. 지역 정부와 지역 거주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면 중앙 정부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새마을운동의 큰 특징인 시장 논리의 도입을 좀 더 확실히 하는 것은 어떨까요?

신상필벌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소통이 원활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비경제적인 분야에도 시장 논리가 도입되는 것이지요.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 그리고 국민에 이르는 소통의 정도를 경쟁을 통해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덕규 (경희대 프랑스어학 1) :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정부가 국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 논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경우, 지역 공동체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의 공동체적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는 경쟁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끈 것이지요.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소통의 문제도 이와 같은 시장 논리의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냐는 오늘의 연구 모임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⑦ 한성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과거 경제성장의 요인을 현재 경제에 적용할 수 있을 까.

박상희(한성대 무역 3):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경제 발전사를 보면 대부분 산업화 이후로 후진국과 선진국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1965 년에서 1990 년대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를 줄여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G20 에 속할 만큼 경제우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안정민(고려대 사학 2):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 시기에 세웠던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출중심의 불균형 성장모형을 채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 내에 소기의 경제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2 차 대전 이후 개도국 등이 개발 계획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많았으나 대부분 한국 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 계획의 본질인 공업화, 개방화를 통해 기술혁신과 수출주도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다은(한세대 광홍 4): 저는 1970 년대 농촌 계몽 및 개발운동인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마을 운동의 이념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이 농촌경제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나 혼자 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고 후손들도 더욱 잘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승(건국대 경영 3): 그 당시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주도형 산업인 중공업, 선박 등을 키우고 경부고속도로 등을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달러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외환보유액을 얻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파독광부 및 간호사 파견입니다. 인력난 부족인 서독에 인력을 파견하는 대신 우리는 독일정부로부터 외화획득이라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와 이바지도 한국경제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종태(경희대 무역 2): 저도 외환보유액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경제위기가 왔을 때 방패가 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파독광부 및 간호사, 한일협정타결청구권을 통한 차관 등이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제공은 중동건설 수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동건설 수주는 우리나라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디딤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973 년도 석유파동 이후 중동국가들은 달러가 넘쳐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한국은 이 기회를 통해 중동건설 진출을 추진했고 현대중공업 진출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여 왔습니다. 더불어 중공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우(한양대 신공 2): 우리나라는 국민참여로 경제성장을 하거나 경제 위기를 극복한 전례가 있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만합니다. 대표적인 국민 참여 경제 부흥 운동으로 새마을 운동이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 것은 '국민투자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저축을 매달 해야 하고 통장을 학교에서 검사하기 위해 회수한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적 저축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모아지게 되고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건설 등에 GDP 의 30%나 되는 기금이 투자될 수 있었습니다.

즉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의 건설을 촉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민의 광범위한 저축과 참여가 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필요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고자 국민투자기금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지요.

경제금융중심지로 성장한 싱가포르도 현재 GDP 의 40%를 저축하고 저축자금을 최대한 경제성장과 개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희(한성대 무역 3):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요소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정예슬(숭실대 경영 3):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파독 광부 및 간호사들을 만나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달하고 밥을 대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는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개인의 큰 희생과 노고를 감수하고 국가에 이바지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지금 현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루어 놓은 경제 상황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봉주영(중앙대 경영 3): 현재 취업난, 저성장 등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비관론이 많습니다. 그것을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성장을 디딤돌을 삼아 더 성장할 수 있는 낙관론의 태도를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과거의 향수에 빠지자는 것이 아닌, '경로의존성'측면에서 경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로의존성이라는 것은 법률, 기술, 제도 등 그 나라에서 한번 형성되면 외부에 엄청난 쇼크가 오더라도 관성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날에 대입해보면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기술, 제도 등 발전이 필수인데요. 신기술에 오랫동안 투자해온 선진국이 후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신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과거 수출, 중공업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성장을 디딤돌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희(한성대 무역 3): 더 나아가서 지금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박세윤(서울대 국문 1): 과거 우리나라 60, 70 년대는 농업국가에서 공업화로 가는 과정이였기 때문에 고성장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중국만 봐도 최근 20 년간 산업화되면서 엄청난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중국 경제도 주춤해지고 성장을 계속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큽니다.

이처럼 국가는 일정 수준의 산업화, 공업화가 되면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고 조금이라도 경제성장을 이루기가 버거워집니다. 즉 일정 시점이 되면 경제성장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 나라마다 경제성장률과 목표치가 다른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과거와 다른 현재의 경제상황과 수준을 파악해야합니다.

일찍히 산업화를 이룬 유럽을 보면 현재 1%만 성장해도 한해 엄청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3%에서 더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3%의 성장 유지를 목표로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류민정(성균관대 글경 2): 과거처럼 의무적으로 저축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하자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구효용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이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산업클러스터 조성이나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R&D 투자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1 차 신기술을 개발할수록 외국의 기술을 빌려쓰는 수수료를 내어야 할 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박상희(한성대 무역 3): 우리나라가 신흥개발국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경제개발 5 개년 계획과 파독광부 및 간호사, 중동건설수주, 국민투자기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했던 기성세대의 노고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좋은 점은 짚고 넘어가되,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로를 발판삼아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을 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성장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학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⑧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가 부족한 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개최되었다.

송지나(동아대 경영 3) :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2 차 울산지역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0 년대 우리나라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날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굴레에 빠져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그때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분은 먼저 손을 들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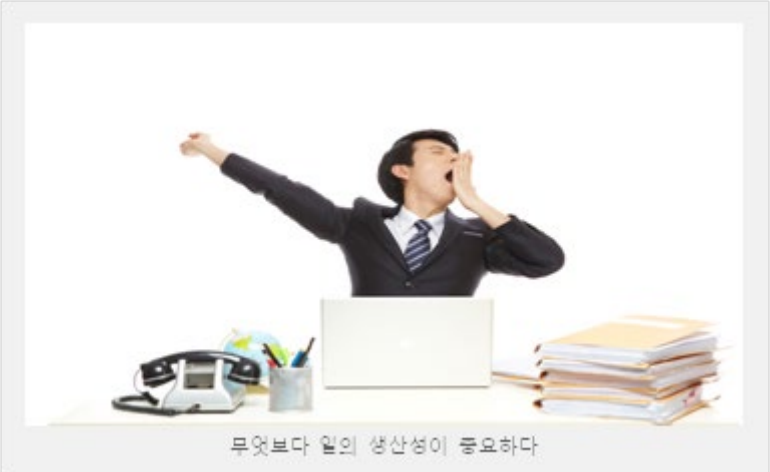
이승현(울과대 간호 4) :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보다 근면하지 않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저성장을 길을 걷고 있는 원인을 사람들의 근면성에서 찾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근면'의 기준이 단순히 많이, 오래, 열심히만 일하는 것과 혼동되는 것 같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엔 무조건 일을 많이 하고 부지런하기만 해서는 일을 '잘' 해낼 수 없고 더군다나 세계를 앞장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생산성 있는 '근면'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사회의 시선이나 기준, 그리고 사회적 노력 또한 시대에 발맞춰 달라져야 하는데 이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연 (계명대 통계 4) : 동의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가치와 지금의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가치가 달라졌으므로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오늘날에는 개개인의 업무자유도도 늘어났고 협동심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팀'을 이루어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근면'을 평가하는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오래, 많은 양의 일을 하는 것보다 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의 생산성이 중요하다

송지나 (동아대 경영 3) :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과 효율적으로 생산성있게 일하는 것, 어느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일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정예민 (대구대 건강증진 3) : 먼저 단순히 사람들의 근무태도 등의 근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들, 예를 들면 '자기가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공사를 구분할 줄 알며 업무시간엔 업무에 집중' 등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물론 취업을 할 때에도 기업에서 성적 등의 숫자가 아닌 인성면접을 강화한다면 자연스레 학생들도 이와 관련해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또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최소연 학우가 얘기했듯 부지런히 오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게 일의 '질'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기업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 스스로 일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겠지만 불필요한 겉치레를 없애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만이 개인의 노력과 시너지를 일으켜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나라 전체의 근면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보람 (울과대 유아교육 1) :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부족한 부분을 꼽자면 근면보다 '생산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은 끝났는데 상사의 눈치가 보여 퇴근 못하고 오늘도 야근한다는 직장인의 하소연, 각종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 일하는데 그만큼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여러차례 받아왔습니다. 오래 일하는 것보다 오늘 할 일을 다 끝내면 집에 가서 쉬고 그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일하는 것이 회사나 개인이나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능력은 있으나 여건이 안되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들이고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아이가 있는 여성, 장애우 등은 일을 못한다는 편견을 깨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100 퍼센트 발휘하여 생산성 있게 근면할 수 있는 환경을 나라와 기업에서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만 우리나라가 저성장을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지나(동아대 경영 3) : 네. 우리나라가 현재 부족한 부분은 생산성이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면이나 생산성 이외에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연 (계명대 통계 4) :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소통'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는 이웃 간, 동료 간의 소통이 많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협동심도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지나친 경쟁에 노출되있는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통'이 부족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경쟁이 아니라 진정 멋있게, 제대로 경쟁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1 등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주는 학교생활을 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 개개인마다 다양한 재능이 있다.

이보람 (울과대 유아교육 1) :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부 1 등 성적 1 등만이 최고다, 이것이 아니면 실패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한 가지의 길만을 제시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를 조금이나 비켜나가면 틀린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천문분야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를 못해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토익점수는 낮지만 창의력은 기똥찬 사람도 있을 것이며, 자격증 한 두개쯤 못따도 일머리는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길은 여러 개 입니다. 또 그 성공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돈 많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는 게 다인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성장해야 할 분야는 아주 다양합니다.

또 그 분야에 맞게 필요한 인재도 다를 것입니다. 학창시절때 성적 1 등, 좋은 대학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할 수 있는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인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재들이 대기업 취직을 위해 똑같이 한 곳만 보고 달려가는 현 상황을 벗어나 자신의 관심있는 분야에 창업도 도전해보고, 남들 다 하는 토익 자격증 따며 똑같이 취업준비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깊게 공부도 해보고 일자리도 분야에 따라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매치되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정예민 (대구대 건강증진 3) : 또 저는 우리나라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 또한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아래 철저히 계획적, 체계적으로 실행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계획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최근 일본이나 중국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더 비교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나라는 한발 늦은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역사 문제에서는 더합니다.

독도 문제부터 하시마섬 유네스코등재, 자국 컨텐츠 홍보등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 철저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이 이슈화가 되거나 이미 문제가 벌어졌을 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일관하고 있어 국격을 심히 훼손할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와 직결되는 나라의 이미지 관리 또한 제대로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부분은 비단 역사분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월호사건, 메르스사태 등 여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고 관리 또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요? 새마을 운동을 시행할 때도 국민들에게 가장 요구했던 것은 정신이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 이러한 정신이 없으면 저성장의 굴레도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또한 앞장서서 이러한 정신들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끝까지 묵직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송지나 (동아대 경영 3) : 네 의견 잘들었습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재정비해야 할 정신은 '근면, 자조 , 협동'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대가 변화한 만큼 일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나라와 기업에서 생산성 있게 근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양성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역사문제 및 각종 시스템의 재정비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이 아닌 체계적인 계획 아래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⑨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용지수(한림대 언론 3) : 지금부터 한림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9 월 1 일, 한국 선진화 포럼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위기 극복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창립 10 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언론정보학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경제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경제 발전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 정책은 수출 확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기술, 그리고 자본을 도입해 경제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바로 우리나라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성장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인구에 비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외국과 무역을 확대하려면 기술이나 자본의 교류도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영토를 확장해야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해 규모의 경제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역확대 등 경제영토 확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영토 확장의 방법으로는 오픈시스템(Open System)을 구축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이고, FTA 를 통한 무역 확대로 글로벌 무역 거래 간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무역을 계속 확대하려면 우리의 주요 무역 대상국과의 FTA 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다른 나라들과 FTA 를 맺는 현실에서 우리만 제외된다면 우리의 무역환경은 급속히 악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주하(한림대 언론 3) : 저 또한 용지수 학우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European FTA(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사이의 FTA) 등과의 FTA 를 발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규모나 산업구조를 볼 때 그들과의 FTA 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선 그들은 시장 규모도 미미하고, 또 그들이 우리의 산업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미 FTA 는 시장규모로 보나 우리의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앞서 한국이 미국과 FTA 를 맺었다는 것도 한국의 입장이 강화되는 의미가 있어 더욱 관심을 갖게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시장 규모가 큰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우리의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진휘(한림대 언론 3) : 그러나 큰 나라들과 FTA 를 계속 맺을 경우 우리가 취약한 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미 FTA 발효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나라의 농업부문과 일부 서비스부문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과 FTA 를 체결하면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있지만, 피해 부문을 어떻게 보상하고 경쟁력을 높여주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또 우리의 장기적인 진로를 이해하고 정부와 같이 협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장래를 보장하는 것임을 알고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전반에 만연한 경제에 무관심한 태도를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지수(한림대 언론 3) : 시장 규모가 큰 나라들과 FTA 를 맺어 수출시장을 확대하되, 정부와 국민들은 각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두 학우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원종현 학우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원종현(한림대 언론 3) : 저는 지난 1960~70 년대에 있었던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정부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시장의 역할)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도적인 계획과 공공재를 통한 지원 없이 시장에만 의존했을 경우, 우리나라가 30 년 만에 이룬 성과를 얻기 위해서 100 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세대 안에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의 힘과 정부의 힘을 합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항상 제기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 초기 때는 민간기업의 기반이 약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능력이 약해 정부역할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세계수준으로 각성한 1980 년대와 1990 년대 이후에는 민간부문이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해외자원 개발, 기술인력 양성 등에서 정부보다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장 초기에는 정부가 더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민간부문이 모든 면에서 앞장서 가고 정부는 오히려 뒤따라 가며 보조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또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나 공공재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정부역할, 그리고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이나 개인을 위한 정부지원 등을 계속하며, 시장실패를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 내에 진입하면 정부역할은 경제성장보다는 시장기능이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데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이나 독일도 높은 복지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하기도 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입니다.

용지수(한림대 언론 3) : 네 정부가 경제성장보다는, 시장실패를 막는 등 시장 기능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지원을 계속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원종현 학우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경제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경제 발전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좋은 의견 발의해주신 학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⑩ 용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강의 기적' 을 일궈냈습니다.

장대혁 (용인대 물류통계정보학과 2)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학기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했으며 일자리가 부족하며 시장이 불황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로는 대기업 위주라는 점이 지금에 와서는 위기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에 대해 재조명하면서 현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 무역 대국으로서 상위 10 위 안에 손꼽힐 수 있는 이유를 딱 하나 꼽으라면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 인당 국민총생산(GNP)를 1961 년 100 달러 미만에서 1995 년 1 만 달러를 넘어서게 만든 이 성과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성과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이루어 내기에는 기적입니다. 그렇기에 현 경제 상황의 기반을 만들어준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은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송해용 (아주대 경영학과 3) :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부작용이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는 많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이 타격을 입는다면 그 밑에 딸린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줄줄이 도산하게 됩니다. 대기업 자체가 파산할 정도의 위기가 아니어도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지만 그 여파가 아래로 퍼지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는 내수 시장의 침체를 야기할 것입니다.

급격한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탄탄하지 못한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많은 책임을 져야할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이 성공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서경 (성균관대 경영학과 4) : 송해용 학우 의견에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람을 뽑으려는 데 없다고 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아닌 많은 벤처 기업과 중소기업들로 어우러진 경제 생태계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국민들에게 그곳만이 절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라는 인상을 주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야기하고 경제 성장의 저해 요소입니다. 특정 분야를 키우기 위해 특정 기업을 키워줬다면 그 기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공헌과 그 역할을 나누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마냥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손하경 (고려대 심리학과 3) :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에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1960 년대 당시에는 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됐던 시기였고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했습니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전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필수였고 이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경제 문제나 그 뒤에 생긴 일들은 그 당시의 정부와 대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계획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지금의 풍요로움을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허송주 (아주대 심리학과 3) : 반대합니다.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은 35 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물론 중간에 정권이 몇 번 바뀌긴 하지만 이를 한 틀로 묶어본다면 정부는 분배도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많은 성과가 나오는 시기였고 전문가들이 붙었었다면 그것이 불러올 부작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것까지 책임지지 못한 당시 5 개년 계획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 뭐합니까?

자살률 1 위에 여러 안 좋은 1 위 타이틀은 다 달고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너무나 낮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제대로 된 시민 의식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과연 성공적일까요?

최아영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3) : 반박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지수가 낮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경제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좋은 물질적인 환경에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와 교육, 사회 분위기 등의 문제입니다.

50 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이들이 감자 하나를 나눠 먹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사는 그런 나라가 지금은 많은 아시아들의 우수 경제 성장 모델이 됐고 많은 문화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IT 강국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1 위에 달합니다. 모두가 제대로 된 곳에서 교육을 받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물질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경제 성장이 기반이 됐으며 그 중심에는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당시 많은 이들이 반대했습니다. 만약 이 도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에 와서 그 계획을 부정하는 것은 이런 결과가 나왔기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도전을 통해 이만큼의 성과를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봐도 이 기간에 그만큼은 하지 못했기에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정말 '성공적' 이었을까요?

장대혁 (용인대 물류통계정보학과 2) : 네,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정리 해보겠습니다.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좋은 성과를 보인 것은 맞지만 현재의 안 좋은 경제 상황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많이들 지적하셨습니다.

특히나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지만 시민의식과 행복지수 그 외에 많은 불명예스러운 부분의 통계 수치 1 위 등을 보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한 경제 개발인가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야기한 당시 계획의 부작용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단기간 보여준 통계 성과나 자료를 통해 이런 성장을 보여준 나라가 없으며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기에 이를 높이 평가해주셨습니다. 또한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는데 이를 반전시킨 이 계획은 대단히 고평가 받아야 하며 현재의 풍족한 상황에서 약간의 배부른 소리가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 일이어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고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그 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며 그 잘못된 부분 또한 수용해야 합니다.

지금에 맞는 또 다른 경제개발 5 개년 계획과 같은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실행한다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니 전문가들과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정부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무모해 보였던 도전이 지금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듯이 당시의 사례를 본받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도전정신을 갖고 일을 행한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활기찬 토론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⑪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조준상 (경영 3):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진행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이어, 이렇게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내수 부진에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올해 3 분기 경제성장률은 2% 밑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위기 극복 및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의 도전정신과 더불어 정부, 국회의 조력자 역할이 필요하다.

조준상 (경영 3): 우선,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도전 정신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구호 하에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하나가 되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경제발전에 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70 년대의 새마을운동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범국민적 도전 정신을 통해 경제발전 신화를 이뤄낸 과거와 달리,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도전 정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모델 개편, 구조조정 등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경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가치창출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적인 경제행위를 이루려는 과거의 도전 정신이 다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유진 (경영 3): 저도 기업들이 지금의 상황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더 도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경제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활동을 하려면 먼저 첩첩산중의 규제부터 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천송이 코트'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에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전지현 씨가 입었던 코트를 사고 싶어도,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국내의 복잡한 온라인 결제시스템에 막혀 구매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사건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삭제했지만, 1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관련 규제만 없어졌을 뿐, 이로 인해 생긴 결제 시스템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업이 올바른 경제행위를 하는데 있어, 정부는 '천송이 코트' 사건과 같이 경제 행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경제 정책을 통해 기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훈 (경영 3): 저도 김유진 학우와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는 국회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현재 우리나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국회 본연의 입법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인데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12 년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은 새로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60%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 야당 서로 간의 협조 없이는 법안 상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지만 여, 야당 간의 불필요한 힘겨루기와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생긴 이러한 구조는 최근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경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거나, 통과가 되더라도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 시기가 지난 이후에 되게 하여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학우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내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되어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선진화법은 이러한 협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혁신형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조준상 (경영 3):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도전 정신이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지금의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학우 분들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범규 (경영 3): 저는 창업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나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일화를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창업 관련 성공담을 주위에서 접하기 힘듭니다.

요즘은 청년층이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창업을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크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형 창업보다는 당장 개인의 밥벌이에 급급한 생계형 창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 OECD 조사 결과, 한국의 창업 유형 중 생계형 창업의 비중은 63%로 최상위 수준, 반대로 혁신형 창업의 비중은 21%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 년 동안 우리나라 500 대 기업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창업 기업은 46 개에 불과하구요.

이중에서도 신기술과 신사업을 바탕으로 한 혁신형 창업의 기업은 네이버와 넥슨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층이 취업과 이를 위한 스펙 준비에만 몰두하는 것보다는, 혁신형 창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준상 (경영 3): 구체적인 수치 사례를 들어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많이 감소한 것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혁신형 창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혁신형 창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지수 (경영 3): 저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창업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과, 추후에 다시 취업으로 진로를 변경했을 때 나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창업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창업이라는 것이 초기에는 개인 수준에서 큰 규모의 대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 또한 창업에 대한 실패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창업 실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창업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준상 (경영 3):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주위의 누군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부터 이것에 대해 '설마 되겠어' 하는 식으로 바라보고, 당사자가 실제로 실패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드는데요. 앞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혹여나 실패했을 경우에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독려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시립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았습니다. 학우 분들 모두가 참신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종합했을 때, 지금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도전정신을 재현하여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하며, 정부는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이를 돕는 역할을 하고, 국회는 소모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제 때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계형 창업 위주의 창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 실패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고, 이를 독려하는 창업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금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⑫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높은 교육열은 경제발전의 한 원동력이다.

최현수(예술 3):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서울지역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9 월 1 일(화)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경제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에 대한 여러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한국경제발전의 세계사적 의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로 다루었던 “인적자본과 높은 교육열”을 선정하고, 과연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의 발달과 높은 교육열의 원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암기위주의 교육이 아닌 창의적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환(카톨릭 교육 3)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교육열이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열은 한국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교육열의 원동력이 약간의 열등감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침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국토가 피폐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졌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았을 때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교육에 힘을 쏟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열등감을 통한 교육열은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지나친 시험 스트레스나 입시전쟁, 취업전쟁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대일 (홍대 예술 3) :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학문을 중시하고, 예절을 중시하는 성리학과 유교 중심의 문화권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특성이 지금까지도 공부를 통한 출세, 입신양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겐 학문 중심의 민족적 특성이 있다.

박송화 (홍대 예술 4) : 저는 이러한 높은 교육열의 부작용도 물론 있지만, 이러한 교육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화 시대에서 높은 교육열을 통하여 바른 인재를 기르고, 세계적인 인재로 만들어 낸다면 우리나라의 위상도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준(외대 어문 2) : 우리 조상들은 작은 국토와, 적은 인구, 부족한 자원에도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올바른 교육을 이어받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으로 나아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으로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최현수(예술 3) : 많은 분들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면 단순 암기의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세계화에 걸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실천적, 창의적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게 맡기는 입시로 변화된다면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 인재들이 많이 나와 우리나라 발전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발전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에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진화 과제 4:

공동체의식(나눔, 배려 등)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제 83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공현덕(삼육대학교 경영학과)


제 83차 월례토론회 '공동체의식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나라는 현재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분단 후 급격한 발전을 통해 풍요로움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 경제력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선진화는 아직 경제적인 측면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선진화, 즉 남을 배려하고 신뢰할 줄 아는 공동체의식이 확립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3 월 27 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여러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제 83 차 월례토론회를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토론에서 박연수 고려대 교수는 "공동체 의식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공동체적 가치를 세우고 규범화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습득시키고, 이를 어길 때는 수치를 느끼게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제재를 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성빈 장신대 교수는 "우리사회를 위한 선진화 작업에 앞장서야 하는 가정과 학교, 언론 등은 이 시대에 혼란을 겪고 있는 집단"이라며 "이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화의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와 동시에 (주도적인 공동체의식 선진화가)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은 "집단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모델들을 발굴하고 지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각 종교단체들이 집단의 이익을 접고, 올바름으로 향하는 본래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언론과 방송에서 오락이나 사건사고보다 감사와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방향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원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는 연기자로서 후배들을 지도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인간이 되어라'이고, 진정한 스타가 되기 위해 인간이 되는 것을 강조한다"며 "때로는 연습이나 무대를 가볍게 생각하는 후배들에게 따끔한 잔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공동체의식을 키우기 위해선 사회의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발제자로 토론회에 참여한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는 “공동체 의식의 대표적 덕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질서준수”라며 “나눔과 배려의 덕목은 ‘남에게 베푼다’는 의미가 강한데 반해 질서준수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의 최소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삼승 변호사는 이어 “질서준수는 남의 평안을 해치지 않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도 역시 그렇게 해줌으로써 결국 나의 평안도 보장받는다는 반대급부가 따라온다”며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쉽게 실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 ‘법을 지키면,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규칙이나 규율 등을 어겨가며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인 저는 학교 캠퍼스에서도 종종 개인의 만족이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학생들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강의실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앉기 위해 여러 자리를 가방이나 책, 필통 등을 올려놔 친구들의 자리를 미리 맡아놓고, 다른 사람들은 앉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인 야구를 보러 갈 때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지정 좌석제로 운영되는 인천 문학 야구장이나 잠실 야구장의 외야석에서 야구를 관람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에 가방을 올려놓거나, 치킨, 과자 등 먹을 거리를 올려놓아서 다른 사람들이 못 앉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질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니까요. 양삼승 변호사의 말처럼 나누어 주는 것, 배려하는 것은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준다’는 느낌이 들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단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질서를 잘 지키는 문화는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가정교육’에 있습니다. 가끔 음식점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제 멋대로 뛰어다니는 꼬마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음식을 들고 있는 손님이나 종업원과 부딪혀 음식을 바닥에 쏟기도 하고, 접시가 깨지기도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꼬마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까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상적인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을 혼내고, 조용히 시키고,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정상적인 부모님'들이 조금씩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아이만 생각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려 노력합니다. 그 때와 장소가 어디든 간에요. 게다가 다른 어른들이 자신의 아이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타이르려 하면 '왜 남의 귀한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되려 따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인 줄 모르고 제 멋대로 행동하고, 그에 대한 죄책감이나 문제 의식 없이 자란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별반 다른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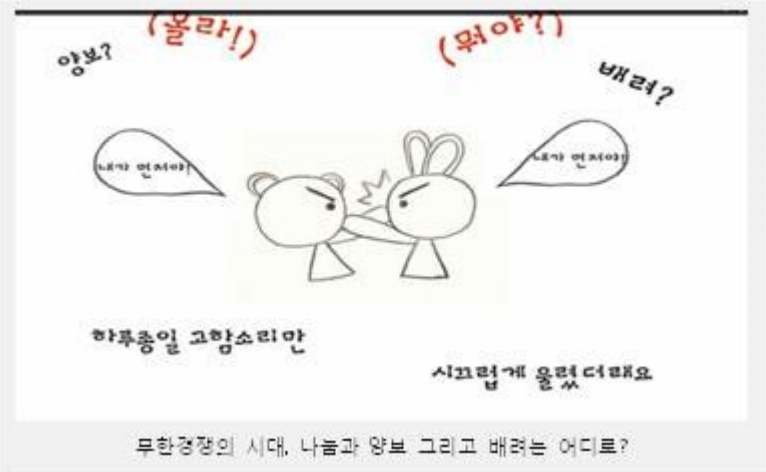
조기 교육이니 뭐니 하면서 더 늦기 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수학 공식 하나라도 더 가르칠 생각 대신,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부터 확립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요?

확실한 인성교육의 방안으로는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길을 걷다가 부모님이 먼저 이웃 어른에게 인사 하고, 자리를 양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줄을 잘 서는 등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몸소 실천한다면, 아이들은 분명 그와 같은 행동을 쉽게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의 선진화는 바로 여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질서를 지킴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럼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의 선진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_idDNPD2VV4
http://www.youtube.com/watch?v=uKou1dRe4O0

② 김민균(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우리는 살맛 나는 세상을 살고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즉각적으로 “네!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선뜻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사회가 이익추구와 경쟁의 논리로 인해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한국선진화포럼이 3 월 27 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연 제 83 차 월례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질서와 나눔, 배려 등 공동체 의식 선진화를 위한 실천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동정과 친절, 관대함 등의 실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언론에 의한 사회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지요. 또한, 선진화의 핵심요소인 ‘공동체의식’ 씨앗을 뿌리는 방법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는 머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닌 가슴에 호소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해야 하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질서준수라고 하였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덕목은 ‘남에게 베푼다’는 의미가 강한데 반해 질서준수는 ‘남에게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강조하였지요.

박연수 고려대 교수는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규범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임성빈 장신대 교수는 선진화 작업에 앞장서야 하는 가정과 학교, 언론 등이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상원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는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교육은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고,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은 집단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모델을 발굴하고 지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언론과 방송에서 오락이나 사건사고의 흥미위주보다는 감사와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배려〉의 문화가 정말로 중요할까요?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119 구급차가 교통사고로 하지 절단이 된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단지 몇 초,몇 분으로도 생사가 좌우될 수도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지요. 때는 퇴근시간이었고, 차들은 꽉 막혀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1 분 1 초..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보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차량 좌, 우로 좀 비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길을 비켜주세요" 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는 119 대원의 목소리에도 차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수많은 허구의 '구급차' 들을 기존에 봤었더라도, 설사 거의 모두가 다 허구이더라도 하나 쯤은 진짜 긴급한 구급차량임을 인지하고 비켜주는 것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의식 선진화가 이루어진 사회이며, 바람직한 국가가 아닐까요?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들 혹은 '남들도 다 하는데 뭐'라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배려〉라는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몰아내고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는 상호존중을 토대로 살 맛나게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KBS 의 다큐멘터리 '공감'에서 나왔던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맹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사진기를 주고, 그들을 통해서 눈이 아닌 오직 가슴과 청각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 〈손끝의 기적〉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훈훈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주려고 하였고,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간의 침묵과 절망이 작게나마 "배려"라는 의식을 통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조선시대 때, 한 맹인이 밤에 호롱불을 키면서 돌아다니자 지나가는 행인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맹인이 호롱불은 왜 들고 다니시오? 어차피 안 보이지 않소?" 라고 하자, 맹인은 "저는 비록 앞이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혹여 앞이 안 보이는 저 때문에 부딪힐 우려 때문에 호롱불을 키고 다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 맛 나는 세상을 위한 배려

우리민족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살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수식어를 얻으며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샀지요.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물질문명의 지배와 점점 확산되고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어가면서 나눔과 배려의 미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러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도 자각의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정신으로 단순한 나눔과 배려를 넘어서는 자신의 위치에 맞는 책임감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위치에 맞는 책임감 실천이다.

현 시대의 무한경쟁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자신의 위치에 맞는 책임감 실천이 바로 우리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배려의 정신 아닐까요?

우리는 이를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서 익숙해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려'의 정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몸과 마음에 익숙하게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사회적 통합의 〈공동체 의식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사진 1,3 - http://youtu.be/lM-iaa9_Gqc
사진 2 - http://youtu.be/D2sUIs8OwZo
사진 4 - http://youtu.be/H_rUaiKnVio

③ 김수현(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지난 3월 27일에 열린 선진화 포럼 83회 월례토론회

한국은 지난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고 어느덧 선진국 진입 문턱에 다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GDP 를 비롯한 여러 지표들이 높아지는 동안 반대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눔과 배려, 공동체 의식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는 이웃간의 '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이기주의 발달로 인해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러한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건, 사고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팽배한 공동체 의식의 부재 때문입니다.

지난 3 월 27 일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 주최한 제 83 차 월례토론회 '공동체 의식(나눔, 배려 등)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열렸는데요. 이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 선진화를 위한 해결책에 대해 토론하고 지적 교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임성빈 장신대 교수는 주도적인 공동체의식 선진화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해결방안으로는 양삼승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가정, 학교, 언론의 교육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에 대한 정확한 목표설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강 미황사 주지스님은 불교의 관점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개인의 삶 자체가 공동체의 삶이라는 접근 방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나부터'라는 주인의식과 동시에 각 종교단체들이 집단의 이익보다 공동체 의식을 이끌 수 있는 본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하며, 언론과 방송 또한 공동체의식의 메시지 전달에 앞장서야 함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톨릭대 최준규 신부는 그리스도교의 공동체를 모델로 삼아 '공부'에서 '배움'으로 복귀해야 하며, 전인교육을 토대로 상생과 정직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박상원 서울예대 교수는 인성교육의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공동체의식을 위해 사회의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변화에 움직임을 주도함과 질서, 나눔, 배려의 앙상블을 통한 윈-윈 전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연수 고려대 초빙교수는 사회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공동체적 가치를 세우고 규범화함과 동시에 캠페인을 넘어 요람으로부터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인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공동체의식 중 질서, 나눔, 배려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눔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며 개인과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배려는 상호존중을 토대로 삶을 풍족하게 만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법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언론을 활용한 사회교육을 해결책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특히 이 중에서 양삼승 변호사가 지적한 이익과 경쟁,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적인 현대 사회에서의 질서와 나눔, 배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물질적 풍요는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입니다.

과열된 경쟁의식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이익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니 나눔을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은 무질서의 삶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함께 쓰는 강의실,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1 학년 때 일입니다. 교양 수업을 듣던 중 교수님께서 학교 생활에서 불편을 겪은 일이 없느냐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조금 머뭇거렸지만 몇 가지 불편사항들을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교의 건물과 같이 물리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학생들은 곧 이어 같은 학생들의 모습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엘레베이터를 탈 때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공동물품을

함부로 사용한다.", "책상이나 도서관 책에 낙서를 한다."와 같이 사소하지만 불편을 주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계시던 교수님은 잠시 뒤 학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불편함을 느낀다면 왜 나서서 이야기하고 고치려 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한 우리 학생들 본인은 어떤가요?"

교수님의 따끔한 지적을 들은 학생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강의실 책상에 두고 나가는 쓰레기를 지적하였는데 저 또한 귀찮다는 이유로 강의가 끝난 뒤 치우지 않고 나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과 배려, 질서와 같은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선진사회에 근접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공동체 의식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공동체 의식의 시작, 가정과 학교의 교육에서부터

그렇다면 나눔과 질서, 배려와 같은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특히 어릴 적부터 가정과 학교와 같은 집단에서 생활하며 익히는 공동체 의식이 바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과 학교에서 나눔과 배려, 질서의 의식을 생활 속에서 배우며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는 '역지사지'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란 무엇일까요? 역지사지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잠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교육이 도와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어떨까?'와 같은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나눔과 배려, 질서의 의식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러한 나눔과 배려, 질서를 실천하였을 때 단순히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눔으로 인해 얻는 행복과 질서와 배려를 통해 불편함을 해결 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과 지도를 통한 배움이 바로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인한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작은 변화가 모여 사회적으로는 모두의 큰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위해, 우리 사회의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나눔과 배려, 질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면 우리는 더욱 풍족한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지 출처 1 : http://youtu.be/SpFFJ3krD0w

④ 김희정(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선진화포럼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더욱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이루어진 경제발전은 과거 우리 사회의 중요 가치였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을 무력화시키고 이익, 효율성, 경쟁 등이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는 오늘날의 사회를 가져왔습니다.

무너진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해 한국선진화포럼은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종교단체들이 참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양삼승 변호사는 질서준수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공동체 의식의 최소한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박연수 고려대 교수는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규범화하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람으로부터의 교육을 위해 정부는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임성빈 장신대 교수 또한 인성교육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정부 주도 하에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필요함을 강조하셨고 가톨릭 대학교의 최준규 신부는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상생과 사랑이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황사주지 금강스님은 각 종교단체들이 집단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는 국민들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주는 본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언론과 방송이 오락 프로그램보다는 공동체의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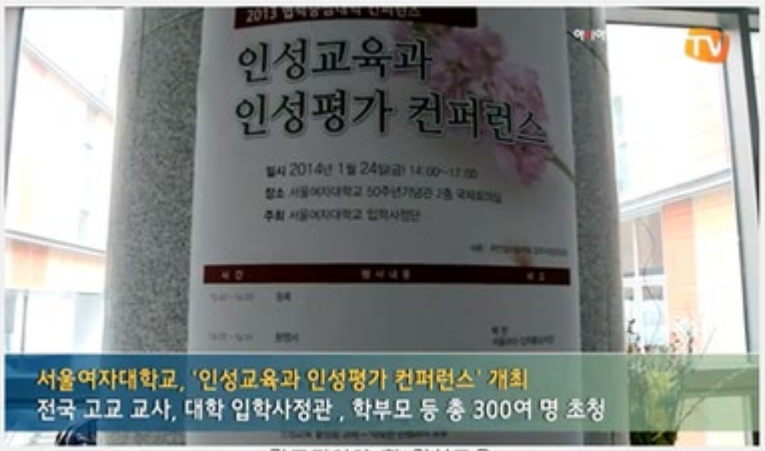
공동체 의식 함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들을 어느 정도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란 그것을 내면화시켰을 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배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체 의식 부재에 대한 문제는 자주 대두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파급력이 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의식 개선을 위한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인성이 발달되는 과정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을 기르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한정된 수업시간에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머리로 아는 것과 몸소 실천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인성교육의 대상이 학생에 제한되지 않고 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조되어야 할 인성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대상은 학생이지만 이 학생들을 주도하는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는 교사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은 곧 학생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배우게 됩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에 비해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이 좁아지고 따라서 교육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교단에 설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두 가지 인성교육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교육자를 꿈꾸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과목은 그 수가 다양하나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 만큼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검사일 뿐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이를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지 배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저 또한 교직 이수자로서 교직적성인성검사에 참여했으나 검사 문항도 형식적인 항목으로 예비교사들의 인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교직적성인성검사는 이미 인성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뿐이며 이들이 인성을 함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더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들의 인성평가가 아닌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예비교원들이 수강하는 커리큘럼에 인성교육에 대한 강의를 추가하고 이를 필수 강좌로 하여 교육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교사들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배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예비교원들에 대한 인성교육 확대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교과지식을 통해 어떻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깨닫게 하고 교육현장에 나가 이를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합니다.

반면, 현직 교사들을 위한 공동체의식은 한 학년을 맡은 담임들이 모여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이루어가는 활동을 학교 자체에서 진행함으로써 확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동체의식을 바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습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모여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자연스럽게 남들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게 한다면 학생들 또한 교사들이 서로 협동하는 모습을 보며 이를 무의식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입시제도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 느낀 것, 그리고 마침내 달성한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학생들과는 차별화된 스토리를 가지게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등에 진학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나 대학 수시에 필요한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다수를 목표로 하는 변화는 어렵지만 소수를 목표로 하는 변화는 좀 더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앞서 그들의 지도자인 교사들의 인성교육이 선행된다면 위와 같이

성인이 된 교사에게는 설득력 있는 인성교육을,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가는 선진국민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부유한 선진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8WEuHvmx7nk

⑤ 남아영(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3월 27일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 83차 월례토론회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의 초입에 와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는 어느덧 선진국이라 부르기에 제법 어색하지 않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정치·사회·문화적 선진화의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회 분위기의 선진화를 위한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제 83 차 월례토론회에서 여러 분야의 사회 명사들께서는 이처럼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현실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공동체의식 중 질서, 나눔, 배려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가정교육, 학교교육, 언론을 활용한 사회교육으로 선진화를 주도해가야 한다고 하셨고, 임성빈 장신대 교수는 공동체에 대한 정의 역시 논의되어야 하며 종교공동체들이 제시하는 가치의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금강 미황사 주지스님은 불교의 관점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개인의 삶 자체가 공동체의 삶이라는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여 '나부터'라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보셨고 최준규 가톨릭대 신부는 그리스도교의 공동체를 모델로 삼아 '공부'에서 '배움'으로 복귀해야 하며, 전인교육을 토대로 상생과 정직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박상원 서울예대 교수 역시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널리 퍼뜨려 질서, 나눔, 배려의 앙상블을 통한 윈-윈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박연수 고려대 초빙교수는 캠페인을 넘어 발상의 전환을 토대로 한 공급자의 변화와 규범화 및 교육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과 인식의 변화를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동체의식과 같이 정신의 영역을 다룰 때의 접근 방식은 결국 각각 구성원들의 계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최근 여러 장면에서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는 모습을 목격해왔습니다. 그 근본에는 공동체의식을 습득하는 대표적인 장인 교육 현장에서 역시 경쟁이 만연하고 공부의 방법 역시 '혼자' 하는 방식에 그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 가지, 시민교육 활성화와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 시민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는 공부의 과정에서 주요 교과에만 몰입하지 실질적인 시민교육에는 그 할당량 역시 줄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민교육으로 일컬어지는 '사회/도덕' 교과는 고교 교육과정 개편으로 2014 년도부터 일선학교에서 없어지고 2015 년부터는 고졸 검정고시에서도 선택과목으로 전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우리와 달리 선진국인 영국은 2013 년 Key Stage 3, 4 (7~11 학년) 과정에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을 확대하는 방안을 펼칩니다. 싱가포르 역시 2014 년부터 인성 및 시민교육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선진시민의식이 잘 확립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3 학년 과정인 떼르미날 교육과정에서 시민, 법률, 사회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점차 시민교육의 범위를 늘려가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더욱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점차 이를 줄여가는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지요. 물론 교육을 통해 모든 것이 바뀌리라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바꾸는 데에는 잦은 노출과 주변의 영향이 분명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겠지요.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해 이루는 공동체의식 함양

이어 저는 혼자만의 '공부'가 아닌 '배움'을 통한 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공동체의식 결여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 입학이라는 단기적인 목표에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에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을 꺼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요.

이와 달리 선진국인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활발한 학습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이러한 학습동아리 참여율이 무려 60 퍼센트가 넘는다고 하고요. 이에는 분명 국가적인 지원 역시 뒤따르고 있습니다.

1947 년 이후 정부 기금으로 학습동아리 리더의 급여와 학습자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조직과 실천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는 등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나 더 많은 홍보와 확실한 자리잡음을 위해 노력할 때가 아닐까요?

특히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만드는 주체적인 학습동아리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동아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 조직한 모임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토론을 중심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자연스레 질서나 나눔, 배려의 공동체 덕목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래가 아닌 여러 연령층과 교류하게 된다면 자연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에 맞게 행동하는 힘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동체의식은 지식적으로 습득하기에 머무르기보다는 실천과 함께 가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학습동아리 형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배움을 공유하도록 시스템적 여건이 어느 정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공동체를 활용하여 이를 정착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산공동체 학교와 같이 한 지역의 공동체가 모두 배움의 장으로 인식된다면 공동체의식을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요?

공동체의식이 선진화 된다는 것은 분명 함께 공유하는 문화, 그리고 남을 고려하는 마음가짐을 갖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시민교육을 정비하고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건설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대부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배움을 공유하도록 시스템적 여건이 어느 정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자연스레 질서, 나눔, 배려와 같은 공동체의식을 학습하고 몸소 실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두 측면을 바탕으로 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서와 나눔, 배려가 모든 국민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순간,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시민의식의 부재가 마침내 해결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선진국가는 그 구성원들이 선진국민이 되는 방법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선진화를 이룩한다면 정치·경제적 선진화 역시 자연스레 이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미지 출처 1 : http://youtu.be/SpFFJ3krD0w

⑥ 배하연(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제 83차 원례토론회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최근 삼성 이부진 신라 호텔 사장의 '택시기사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익'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재 우리의 사회에서 나눔과 배려는 언제나 박수를 받습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의 선진화 역시 중요합니다.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경쟁질서 속에서 한국사회는 공동체의식보다 개인주의의 산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1 인당 GDP 가 약 2 만 4 천불, 잠재적 경제 성장률 3.5%로 선진국 초입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으로 사회적 가치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편중된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서 한국사회는 '성장'의 문제보다는 '가치'의 문제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3 월 27 일 개최한 제 83 차 월례토론회에서 각 종교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공동체의식 선진화의 문제점과 실천방안을 지적했습니다.

양삼승 변호사님은 나눔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고, 개인과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강조하며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법률 등의 강제적 힘이 아닌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박연수 교수님은 공동체적 가치와 규범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것을, 임성빈 교수님은 가정과 학교, 언론 등이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화의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황사주지 금강스님은 집단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모델을 발굴하고 지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언론과 방송에서 감사와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원 교수님 역시 공동체의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의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서·나눔·배려의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사회, 보다 선진화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덕목을 망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덕목에는 '질서', '나눔', '배려' 등이 있겠지요.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나눔과 배려, 질서 등의 공동체의식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과정에서의 문제는 이러한 이념을 '어떻게 실천하느냐'하는 방법론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실천방법 중 가장 근본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이 '교육'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정 혹은 학교에서 시작하는 공동체의식 선진화에 관한 교육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식의 실천을 법 등의 강제적 힘으로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동체의식의 실천은 개인의 도덕성과 의지가 전제되어야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입식, 강요식, 처벌식의 방법이 아닌 설득적이고 이해적인 교육방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중으로 하여금 공동체의식의 실천을 제안하고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디어'의 힘을 이용한 교육입니다. 최근 미디어는 대중이 가까이에 두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대화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대중성과 순발력은 이상적 실천모델을 제공하고 대중들이 이를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공동체의식의 실천을 제안하기에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시한 이부진 신라 호텔 사장의 경우도 미디어가 제시한 공동체의식의 이상적 실천모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언론사는 그들이 가진 창의력과 순발력, 그리고 사회의 흐름을 읽는 날카로운 감각으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미디어를 통한 대중의 인식 개선

대중들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캠페인 혹은 공익광고는 때때로 솔선수범에서 시작하는 가정교육·학교교육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한 공익광고의 효과에 대한 평가 조사에서 피조사자의 81.4%가 공익광고 시청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결과에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질서'를 주제로 한 광고를 시청한 뒤 질서 준수 노력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9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미디어를 통한 인식개선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취가 불확실하다는 가정·학교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젠틀맨'이라는 프로그램은 공동체의식 실천을 제안하는 미디어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프로그램 '젠틀맨'은 임의의 상황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우리사회의 '질서', '나눔', '배려'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폭행당하는 노인을 목격한다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목격한다면?' 등의 상황에서 대중들은 저마다의 공동체의식을 실천하려 듭니다. 관찰대상들은 때로 '이거 젠틀맨 아니야?'하고 프로그램을 의식하는 대사를 던지곤 하는데, 이는 대중들에 미디어가 작용하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미디어가 대중에 공동체의식의 실천을 제안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디어가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활용하기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스토리텔링은 대중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공감대의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설득적이고 이해적인 교육방법이 되기 적절합니다.

공동체의식 실천의 경우는 개인의 도덕성과 의지를 끌어내기 위하여 거부감이 적고 가슴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그 점에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디어는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단시간에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언론은 사회의 경쟁질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교육적 가치보다 이념적 편파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미디어는 선진화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상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하여 공동체의식 선진화의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의 잠재되어 있는 공동체의식을 꺼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식이 사회를 개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통해 감동을 전달하는 것은 시청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실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절망적 뉴스들이 넘쳐나는 이 때, 감동적인 이야기는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시민들의 실제 실천사례를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하면 이를 통한 사회적 실천은 신드롬으로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의무편성을 통해 다양성이 침해되고 직접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선진 한국사회의 정착을 위한 공동체의식의 실천에 앞장서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범 사례의 노출을 통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단, 그 컨텐츠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대중들의 실제 실천사례를 프로그램으로 엮어 보도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여러 효과를 한 번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의 이기적 행위를 어떤 공동체의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광고적 접근'보다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적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앗아갈 수 있다는 우려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가 아닌 언론사 스스로의 심의를 통한 규정으로 다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진국은 경제적 번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천할 때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공동체의식 정착을 위해서는 가정·학교·사회에서 시작하는 설득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중과 친숙한 미디어는 가정과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적당한 수단이지요. 미디어를 통한 스토리텔링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미디어가 가진 힘을 이용하여 이상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대중들의 공동체의식 실천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풍요를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가 필수적입니다. '질서', '나눔', '배려'에서 시작하는 공동체의식에 대해 언론인들이 시대의 사명을 인식하고 사회 변화로의 의지를 가진다면 더욱 선진화된 우리사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⑦ 서연우(고려대학교 국제학과)



3 월 27 일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선진화의 핵심요소인 '공동체의식' 씨앗을 뿌리는 방법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은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 뒤 임성빈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와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상원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삼승 변호사는 "공동체 의식의 대표적 덕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질서준수"라며 "나눔과 배려의 덕목은 '남에게 베푼다'는 의미가 강한데 반해 질서준수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의 최소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의식 속에 있는 질서, 나눔, 배려의 덕목들은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질서라는 덕목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우리 나라는 공동체의식의 최소한이라 할 수 있는 질서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서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 나라

대학교 앞에서도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무단횡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전에 타기 등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인식입니다.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규칙, 법이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바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새치기, 편법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사회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예를 들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우며, 많은 불쾌감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서준수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 내에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질서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인식이 개선되어도 사람들은 순간적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질서준수의 덕목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써, 작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단으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적인 불편함 때문에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이 존재해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연제도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꽁초무단투기처럼 벌금이 부과되는 것과 같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에 한하여 너무 크지 않은 벌금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러한 벌금제도를 단순한 하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벌금제도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특정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특정 행동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국민들에게 부여한다면, 순간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벌금을 내리기 모호하거나 규제하기 힘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먼저 내리고 타기 등과 같이 실질적인 규제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국가 캠페인이나 공익광고를 통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공동체의식과 같이 의식개선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특정 행동만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그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고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벌금제도, 국가 캠페인이나 공익광고를 통하여 그 속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식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질서준수이라는 덕목이 매우 중요한데요. 개선된 인식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우리 나라도 머지않아 나라의 경제적 수준 만큼 시민의식도 그만큼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진 2) http://www.youtube.com/watch?v=JavQ7fVl5v4
사진 3) http://www.youtube.com/watch?v=MlwbLV8zbis

⑧ 송경남(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공동체의 회복으로 부터

중진국에서 선진국의 초입단계를 거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통해 세계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선진국으로 확실한 발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자본이 축척이 된 시민사회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차세계 대전 이후 독립국 중 압축성장을 통해 가장 뛰어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 산업화에 성공하고 선배들의 노력으로 민주화를 이룩하였습니다. 또 GDP 는 6· ○25 전쟁 이후 60 배가 증가하였으며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가 몇 세기를 걸쳐 이룩한 발전단계를 단 60 여년만에 이루어냄과 함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가운데 물질만능주의와 경쟁심화로 인한 개인주의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선진화의 가장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는 지난 3 월 27 일 제 8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 종교계 인사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목소리를 통해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 변호사님은 "나눔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고, 개인과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며 "또한 배려는 상호존중을 토대로 살 맛 나게 하는 반면 배려가 없는 사회는 결코 품격있는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공동체 의식의 성질상 법률의 힘에 의해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며 "결국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교육의 힘으로 이뤄나가야 한다"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임성빈 장신대 교수님은 가정과 학교 언론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화의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와 동시에 주도적인 공동체의식 선진화가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해결방안으로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정확한 목표설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미황사주지 금강스님은 각 종교단체들은 집단의 이익을 접고, 공동체 의식을 이끌 수 있는 본래의 역할을 해야 하며 또한 언론과 방송은 공동체의식의 메시지를 자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 부분에서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박상원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는 연기자로서 후배들을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인성교육의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의식을 키우기 위해선 사회의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화에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박연수 고려대 교수님은 공동체 의식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세우고 규범화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습득시키고, 캠페인이 아닌 요람으로부터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공동체 의식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체의식에는 나눔, 배려, 질서 등 여러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에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대한민국은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촌락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도 몇 가정씩 그룹을 맺어 서로서로를 돕게 하던 제도를 두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경보음이 울려 그 동에 있던 모든 주민이 새벽에 밖으로 대피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경보음으로 인해 하나의 동의 모든 주민들이 대피를 하게 되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있었지만 정작 그들 중 아는 사람은 단 몇 사람밖에 없었으며, 처음 얼굴을 본 이웃들의 숫자가 더욱 많았습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이웃들 간에도 공동체라는 개념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서구문물의 도입은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주의가 형성되었으며 주거형태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정겹던 마을의 개념은 사라지고 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하였으며, 사람들은 서로 이름도 모른 채 소통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웃을 아파트 동, 호수로만 기억하게 된 이러한 소통의 단절은 얼굴 모르는 이웃 간에도 웃으며 인사 나누었던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고 과도한 개인주의, 가족이기주의가 우리사회 전반을 지배하며 서로 경쟁하며 서로가 서로를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오늘날, 나눔, 배려, 질서 등과 같은 공동체의식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에 대한 개념조차 상실한 지금 우리가 더 나은 선진화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의 확립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의식의 부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박연수 고려대 교수님의 말처럼 단순히 캠페인으로 공동체의식에 대해 자각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습득과 체화를 통한 공동체의식의 성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뒷받침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어디서부터 시행해야 할지 출발선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공동체 의식의 부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인지를 파악하여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들에 대해 부분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분에서 전체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생애주기에 따라 계층을 나누게 되면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노인기로 나누어 전체를 모두 바꾼다는 생각보다 각 계층의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 전체의 변화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아기, 아동기 때 형성되는 의식은 평생 자리매김하게 되며 성장하는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유아기와 아동기의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석학, 이어령 전 문체부 장관님께서는 여러 사회 단체와 저명인사들과 함께 세 살 마을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살 마을 운동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과 과거 온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힘을 보탰던 우리 전래의 마을에서 착안하여 마을공동체가 아이를 공동으로 돌보고 어느 집 아이고 누구의 자제인지 다 알고 관심을 가지는 운동입니다.

어릴 적 교육이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 살 마을 운동’ 은 마을공동체가 공동으로 돌보고 서로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결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경쟁이 아닌 어울림이라는 소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릴 적부터의 자연스럽게 접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개인주의 성향의 경쟁문화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와 의식을 배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릴 때 체화하고 습득한 공동체적 마인드는 가슴 깊숙히 자리 잡아 다시금 자신의 자녀에게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어둡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산업화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압축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억압된 시민의식 속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은 이제 그 내면까지 성숙한 선진화를 이룩해야 할 때입니다.

⑨ 이성문(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



한국은 7~80 년대 압축성장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국민소득 2 만 불을 넘어선지는 오래 전이며 현재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고 다들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의식수준 특히, 공동체 의식은 그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매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충격적 소식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선진화포럼은 3 월 27 일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8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각계각층의 인사분들이 참석하여 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금강스님(미황사 주지)은 '나', '개인'이라는 이기심과 분별심 그리고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자각토록 해야 하며 종교단체가 이익에 경도되지 않고 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상원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는 마치 좋은 연기와 같이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앙상블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질서, 나눔, 배려'라는 세 가지 덕목을 선정하여 이를 몸에 와 닿는 방법으로 실천하여야 하고, 이때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의견들 중에서 '교육'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든가, 공동체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한다면 상을 주거나 반대로는 벌을 준다든가 하는 강화와 처벌로는 한 사람 그리고 전체 사회의 근본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라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정, 학교로 나누어 어떤 교육적 접근 혹은 해결방안을 추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은 유아기 때부터 교육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한 사람이 평생동안 가지게 될 가치관의 초기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교의식을 재생산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근대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가부장적 질서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유교이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인(仁)'[1] 즉, '사랑'1 을 실천하고, 실천에 있어서는 예절(禮)을 지키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큰 도(道)가 행해지고 모두가 하나되는 사회를 추구게 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가족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혹은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전통예절'에 관해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면서 이웃 간의 친교정신을 기르게 한다든가, 혹은 대중교통 안에서의 자리 양보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배려하고 지켜야 할 예절과 그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해 새로이 받아들여야 할 인물, 공자

유교이념을 현대에 잘 변용한다면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개인(私)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옳음(義)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도록 할 수 있어 선진 공동체 의식 확립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의 교육입니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은 국영수 중심의 기능적 교육입니다. 과장해서 말한다면 오직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문제풀이를 가르치는 곳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 학교에서 자신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 학교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국영수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고 공동체의식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교과(도덕, 사회과) 또는 실제 공동체활동을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면 교실안에서의 '민주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1~2 시간을 할당하여 반 안에서의 도덕적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되 모든 진행은 학생들에게 맡겨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도덕에 관한 숙고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토론모임의 운영과정을 통해 '공동체' 와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와 의식에 대해 스스로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공부만이 아니라 공부 이외의 공동체 의식, 도덕, 윤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방안들이 채택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사회분위기를 바꿔야 하며 정부에서도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물질적 번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 공동체 전체가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에 따라 사회가 원활히 돌아갈 때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의식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 모두가 교육적 방법을 통해 노력함으로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2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RvCP0-HSR_Q
그림 3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hBb9-PRDC7w

⑩ 이승창(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공동체 의식 부족으로 나타나는 강력범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정치적 선진화는 국민들 의식의 선진화, 즉 문화적 선진화가 그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웃 간에 화목하고, 남을 신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나눌줄 아는 공동체의식이 바로 문화적 선진화를 위한 출발입니다.

지난 3 월 27 일 한국선진화포럼은 각 분야 교수님들과 종교계 인사분들과 함께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의식 선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성빈 교수님는 사회의 다양한 종교 공동체들은 앞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도록 돕는 매개체 등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황사주지 금강스님은 각 종교단체들이 집단의 이익을 접고, 올바름으로 향하는 본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덧붙여 언론과 방송에서 오락이나 사건, 사고보다 감사와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삼승 변호사님는 공동체의식의 성질상 법률의 힘에 의해 강제하는 것이 어렵고 부적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교육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며칠 전 한강공원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먹다 남은 라면국물과 용기를 한꺼번에 버리려는 한 시민이 편의점 관리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분리수거를 자신에게 강요했다고 불쾌해하며 마지못해 신경질 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은 주변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부족한 시민의식은 때로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3 월 26 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1 년 넘게 윗집과 갈등을 빚다가 홧김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는 '이웃사이센터'에는 지난해 수도권을 기준으로 월평균 천 2 백여 건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1 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공동체의식의 부재로 인해서 더욱 갈등이 심하게 빚어지는 층간소음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양삼승 변호사님의 말처럼 공동체의식의 부재를 제도적 강제성으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가정, 학교, 사회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층간소음 배상액을 30%올려 115 만원으로 정하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오히려 층간소음분쟁은 수도권 평균 월 천 2 백여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울산에서 층간소음을 슬기롭게 해결한 행복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사하기 운동을 벌이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인사하기 운동만으로 어떻게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웃은 누구인지는 우리의 관심 밖으로 점차 밀려났으며 이웃간의 소통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니 그 사람을 배려하기 보다 자신이 편한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소음만 내는 존재, 별것도 아닌 일에 불평만 하는 존재로만 여기던 이웃들을 인사운동을 통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며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사정부터 생각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시행한 인사운동은 단순히 인사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은 인사운동 캠페인이었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의식함으로써 불평의 존재가 나의 이웃으로, 배려해야 할 존재로 바뀔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의식하고 배려함으로써 줄어든 층간소음문제

아무리 강력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문제의 해결은 내가 남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알고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가진 것을 나누며 서로 배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남을 배려할 때 나 또한 배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로 시작하는 문화적 선진화를 이룩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선진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⑪ 정원석(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동쪽의 예의가 바르고 서로를 존경하는 나라 대한민국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동쪽에 있는 예의가 바른 나라라고 해서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고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웃어른 공경이나 이웃들 간의 배려와 나눔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왔습니다. 두레나 품앗이 등 힘든 일은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 나아가는 것을 보면 공동체 의식이 강한 나라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서로 돕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나라에서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5 위의 경제 대국을 이룩했습니다. 경제력만 따지고 본다면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공동체 의식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83차 월례토론회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에 따라 한국선진화포럼은 2014 년 3 월 27 일 '공동체의식(나눔, 배려 등)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체 의식에 관한 다양한 선진화 방안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박연수 교수님께서는 공동체 의식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공동체적 가치를 어린 시절부터 교육의 요람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에는 범위를 잡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큰 공동체에는 지구촌, 국가, 사회 등이 있고 작게는 학급, 가족, 친구 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사회로 진출하면서 점점 큰 공동체를 느끼게 됩니다.

공동체는 많지만 우리는 그 공동체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 놀이공원이나 유원지에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여행 중에 만난 한국인은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인사를 더 건네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느끼지 못한다면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동체라는 생각보다 나를 위해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공동체는 학교, 반입니다. 하지만 학구열이 상당히 높은 대한민국에서 시험을 본 뒤 집으로 돌아가면 어김없이 부모님이 남들보다 점수가 높은지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을 친구, 공동체로 인식하기보다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족으로부터 더 큰 공동체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큰 공동체를 보게 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인식의 문제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평가가 많은 대학교 내에서 조별과제를 할 때 자기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나 과제 때문에 조별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조별과제에서 조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더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피해가 되는 쓰레기 무단 투기

또한 조금 더 큰 공동체인 사회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쓰레기 길거리 무단 투기, 길거리 무단 주차 등은 공동체보다는 나를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모습은 교육시스템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도덕이라는 교과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질서, 나눔, 배려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도 성적을 매길 때에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지에는 정답을 적고 행동을 반대로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낮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아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하는 행동이 그룹에 이득을 주는 행동인지, 어떠한 행동이 남들을 기쁘게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 알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한 청소년에게도 칭찬이나 상품 같은 보상을 통해서 자신도 뿌듯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에서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남들을 이기는 방법, 남들보다 앞서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남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 뒤쳐지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잭팟 심리학'의 저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행운은 찾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권도 사는 사람에게 1 등이 당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가며 행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해야 할 이유를 찾아가며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행운이 뒤따른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눔과 배려하며 살아가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눔과 배려로 손해 보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나중에 자신에게 되돌아올 행복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선진국의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조건입니다. 올바른 공동체 의식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이미지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mBgnFo5HuBA

⑫ 주연아(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지난 3월 27일 진행된 83차 월례토론회

저는 친구들로부터 '너 참 예민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실제로 저 스스로도 예민한 저의 성격 때문에 차라리 신경이 좀 둔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제가 친구들로부터 이런 핀잔을 듣는 이유는 바로 주변에서 이따금 마주치게 되는 '배려없는 행동' 때문입니다.

집중을 해야 할 때면 작은 소리 하나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곤 하는 저에게 열람실에서 울리는 진동과 카톡소리는 제 인상을 찌뿌리게 하곤 합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이어폰 없이 동영상을 보는 경우와 학교 수업시간에 울리는 휴대폰 소리, 그리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 심한 낙서가 되어 있는 경우도 기분이 금방 상하곤 하지요. 이렇게 다른이들의 배려 없는 행동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 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행위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공동체 정신의 구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사회에 필요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의논하기 위해 지난 3 월 27 일,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 83 차 월례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에서 양삼승 변호사는 '공동체 정신 확립을 위해서는 질서, 나눔, 배려에 대한 고려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가정, 사회, 학교가 모두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임성빈 장신대 교수는 '우리사회를 위한 선진화 작업에 앞장서야 하는 가정과 학교, 언론 등은 이 시대에 혼란을 겪고 있는 집단'이라며 이 세 주체들이 공동체 정신 실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은 소속 종교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언론과 방송에서 오락이나 사건사고 보다 감사와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방향으로 바꿨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흔히 '공동체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일까요? '공동체 정신'을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질서, 배려, 나눔으로 작게 쪼개 볼 수 있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질서'조차 지키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질서가 만연한 상황이 한국의 현주소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동체 정신 실천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질서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요. 또한 교과서적인 교육보다는 사례 중심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통해 가슴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따금 집안에서 볼일을 보고 난 후에 알고보니 휴지가 다 쓴 채로 있어 마지막으로 쓴 사람이 다소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휴지를 떨어지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사람이 바꿔놓기'처럼 사소한 규칙이라도 이를 지키고자 한다면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다음에 쓸 가족을 생각하며 뿌듯함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학교과 사회에서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잘 실천한 사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가슴 따뜻한 울림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우리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중요하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스토리텔링 방식이란 무엇이며 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걸까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멋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도 여러번 듣는 것보다는 그 대단함을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이지요.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이론처럼 딱딱하게 접하는 것보다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형태로 접하는 것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얼마 전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기억하시나요? 눈보라를 헤치고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면서까지 언니인 '엘사'를 찾아 나섰던 동생 '안나'의 노력을 통해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족은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왕국'처럼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닌 '가족은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무미건조한 문장을 접한다면 영화와 같은 감동은 기대할 수 없겠지요.

이와 같은 스토리텔링 방식을 잘 활용한 예로 서울메트로의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직접 겪은 감동있는 이야기를 공모하고, 이렇게 모은 이야기를 다른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시민은 지하철에서 갑작스레 출산을 하게 되었던 경험을 공모전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임산부였던 당시 지하철 역 안에서 예기치 못하게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할머니께서 안심시켜주시며 주위 사람들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시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자칫 삭막한 장소로 여겨질 수 있는 지하철이 훈훈한 장소로 기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전동차 문에 붙임으로써 지하철에 대한 우호적 인상을 심을뿐만 아니라 읽는 전동차 이용객으로 하여금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널리 전파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스토리텔링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서울메트로의 사례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종종 나오는 개념이 '계단식 학습법'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더 어려운 고등개념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수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덧셈, 뺄셈을 배운 후 곱하기, 나누기를 배움으로써 사칙연산을 익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차적인 방정식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처럼 공동체 정신 실천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법을 알게 된다면 더불어 배려, 나눔 또한 더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⑬ 김예진(배재대학교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점차 세계 속에서 선진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은 매우 드물겠지만, 또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경우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완전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등과 같은 모든 면에서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우리들끼리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 속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보다 나은 사회, 안락한 사회,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덕목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3 월 27 일, ‘공동체의식(나눔, 배려 등)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8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공동체의식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공동체의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질서, 나눔, 배려임을 강조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성빈 장신대 교수는 우리 사회선진화를 위한 과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시하였고, 최준규 신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가 상생과 정직을 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박상원 서울예대 교수는 부모나 선배, 지도자들의 공동체 사회를 위한 질서와 나눔, 배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박연수 고려대 초빙교수는 공동체의식은 우리사회를 이루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라는 생각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공동체의식은 대표적으로 질서와 나눔, 배려로 정의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질서준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자 공동체의식의 최소한을 나타내는 척도와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잖음이 무능으로 보여지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의식은 물론이고 가장 기본시되는 질서 준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기초질서 의식 또한 부끄러운 수준에 이르고 있죠.



영화 촬영으로 인해 통제되고 있는 마포대교

최근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2'가 한국촬영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헐리우드 작인 만큼 그로 인한 높은 우리나라 홍보 효과와 국가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촬영장소인 마포대교의 교통을 통제하고 촬영 협조문을 부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부터 뉴스와 공고를 통해 양해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당일 마포대교는 본인들의 교통을 통제받던 시민들의 "얼마나 국가적 이익이 생기는 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나가야겠다." 라는 짜증 섞인 원성과 항의로 가득했고 무단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 또한 볼 수 있어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최근 옛 터에서 귀중한 문화재를 도굴해 불법으로 팔아 넘겨온 일당 중에 나라에서 보조금까지 받고 있는 '문화재 지킴이'가 속해 있었던 다소 황당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공동체의식의 결여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정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이익과 효율성을 위해 앞장서며 우리 삶 자체에서 국가의 이익이나 공동체의식이라는 개념을 뒤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논리적 설득으로 인한 강요가 아닌, 몸에 와닿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는 양삼승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식이 꼭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품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와닿는' 생각이 공동체의식의 선진화와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질서를 확립시켜 공동체의식 구현의 포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기초질서 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아산과 군산 등 여러 지역 경찰서에서 진행중인 기초질서 준수 홍보 캠페인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생들과 주민들의 기초질서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이 캠페인은 더 나아가 범국민적 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울산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 함양과정' 체험교육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련활동은 후에 학생들의 조화로운 인격 형성과 공동체의식함양을 도와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성장시킬 수 있다는 기대로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공동체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각 지역에서 이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대대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감사 운동 캠페인'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예로 꼽을 수 있죠.

하지만 꼭 이렇게 크고 작은 활동만을 언급하다 보니 자칫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대적인 업무에 의해, 혹은 영향력 있게 남들과 같이 해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활동들의 목적만 본받아 개개인이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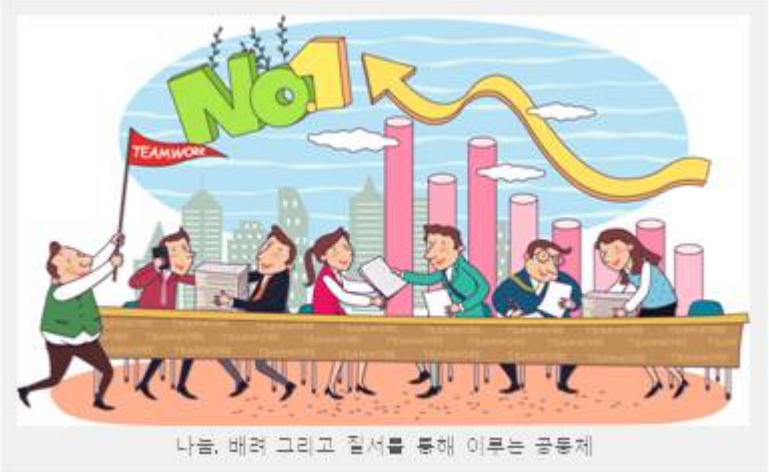
학교 수업, 또는 TV 나 라디오의 공익광고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볼 수 있는 '질서 지키기' 행동처럼 신호 지키기, 무단횡단 안 하기, 우측 통행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습관처럼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기초질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제도가 없다.',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열악한 것 같다.' 라는 말과 생각을 하며 우리나라가 완전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스스로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자신있게 앞으로 내세우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올바른 질서규범과 공동체의식을 보여줄 때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관대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선진화시킨다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모습 역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지 2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gPBrr3wbTLA

⑭ 김유라(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나눔, 배려 그리고 질서를 통해 이루는 공동체

나눔, 배려, 질서라는 이 세 가지 덕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 이 요소들은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배려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제 83 차 월례토론회에서 여러 명사들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우리 사회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금강 미황사 주지 스님께서는 나눔과 배려를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 해결의 주체를 나라고 설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려대 초빙의 박연수 교수님은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교육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조치를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최준규 신부는 그리스도교의 공동체를 발판으로 삼아 공부에서 배움을 터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전인교육을 통해 상생과 정직의 문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예대 박상원 교수는 나눔과 배려를 강조하였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것을 사회에 환원시켜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몸에 베어있는 나눔과 배려를 통해 많은 봉사활동과 기부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금강 미황사 주지 스님의 의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님께서는 한 개인의 삶은 결코 혼자만의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주체를 모든 문제의 해결로 여기면 안되고 항상 공동체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객이 아닌 주인의 마음을 갖는 것이 공동체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개인이 실천할 방법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야 합니다. 그러한 방식이 자칫 '나'만을 생각하여 공동체를 이룩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고치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독일에는 체계적인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민주시민교육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자유분방했던 자유주의와 나치의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취시켜 스스로 판단하고 정리하게 합니다.

한편, 자율적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능동적으로 적응토록 하며 통일 이후에 동독 시민들로 하여금 서독 체제에 조속히 적응 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동독과 서독시민의 상호 이해를 통해 사회심리적 간격을 좁혀 국민 통합을 이룩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특정한 교과의 수업을 통해서 또는 여러 교과에 두루 걸치는 수업원리나 학교 외의 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것들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결정능력을 배양하고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성을 갖추게 하는 것과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여 성숙하고 비판적이며 적극적으로 정치일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교육은 '나'라는 주체에 대한 확실하고 올바른 생각을 우리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선진 의식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엄연히 재산권이 있는 음악, 사진, 그리고 영화 같은 것들을 공유할 때에 관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객이 아닌 주의 입장에서 이런 행동은 더이상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삐뚫게 자라거나 그것 혼자만이 숲을 이룰 수 없듯이, 여럿이 함께 할 때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살 수 있는 세계는 없습니다. '나 정도 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잘해야'라는 생각으로 공동체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⑮ 김현경(군산대학교 해양학과)



나와 네가 만나 만드는 공동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알려주듯이 인류의 발전은 부족사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집단이 모이고 모여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모여 국가를 이루고, 국가가 모여 지구촌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간에게 있어서 공동체라는 것은 태초의 시작에서부터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의 발전으로 개인의 편리함을 위해 발전하는 세상이 되자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룬 사회보다는 집단 속 개인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공동체는 어느새 말뿐인 지구촌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모여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하는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다수가 하나가 되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하나가 된다는 공동체. 정말 공동을 위해 말뿐인 지구촌이 아니라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고, 이를 위해 선진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선진화가 이어져야 하는데, 집단을 이루는 개인의 선진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단의 선진화를 위한 개인의 선진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나눔과 배려, 질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웃 간의 화목과 믿음의 사회로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배려해 주는 따뜻한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은 대중이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배려라는 공동체 의식이야 말로 사람의 향기이고 선진시민 국가의 품격입니다.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선진시민의 실천으로 그에 따른 선진발전을 위해 한국선진화포럼은 제 83 차 월례토론회를 진행하며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실천방안'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 종교,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구체적인 선진의식 실천방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는 공동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질서', '나눔', '배려'로 알기 쉽게 표현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질서준수'로, 나눔과 배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물을 부족하고, 필요한) 남에게 베푼다'라는 의미가 강한데 반해, 질서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로 선을 행하기 이전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강하여, 타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의 최소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박연수 교수는 '공동체 의식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공동체적 가치를 세우고 이를 규범화 하여 어릴 때부터 교육하여 이를 어길 시에는 수치를 느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신대학교 임성빈 교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먼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후손세대가 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도적인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은 '집단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모델을 발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서울예술대학교 박상원 교수는 공동체의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의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따끔한 소리와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공동체의식의 실천을 위해서는 개인의 내실이 정립되어 모범적으로 먼저 선행하여 후손들이 자연스레 공동체의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 양삼승 변호사의 최소한의 공동체의식에 있어서 '질서준수'의 선행이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공통의 목표를 정해두고 하나가 되어 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질서가 없다면, 혼란스러운 단체가 될 뿐입니다. '나하나 쯤이야~'가 아니라 '나라도 해야지!'란 태도로 개인이 지켜야 할 질서를 지킨다면, 전체의 질서는 유지될 것입니다.

개인들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지 않은 집단은 결코 공동체라는 의식을 받아들이고, 이의 선진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개인마다 가진 의식이 선진화된다면, 뒤이어 공동체에서 보여지는 선진국가로의 발돋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선진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지난 월례토론회에서 양삼승 변호사는 질서준수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하여 선(善)을 행한다는 측면보다는 악(惡)을 행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강하여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역할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에서의 질서는 단순히 선의 전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의 되돌림을 위해 필요한 덕목입니다.

선진국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먼저 교육적인 부분에서 주변과 후손들에게 의식을 심어주는 조기 교육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법적 정비를 통하여 세금공제의 기부문화 확산 등 정부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도 공동체의 질서준수와 나눔, 배려를 자연스레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담이라고 보여지는 것도 결국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선진 공동체 의식을 돌려받아 선진국가로 성장하려는 일종의 나를 위한 태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집단의 행동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집단 내에서 선진시민의 행동은 공동체의식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관망합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 선진의식을 키운다는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국가를 위해 '나라도 해야지!'라는 개인적인 선진의식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선진공동체의식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취해야 할 선진의식과 나눔, 배려, 질서준수가 자연스레 나타나지 않을까요?

공동체 선진 의식은 많은 사람이 아닌, 내가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개개인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림 2. 이미지 출처 : http://youtu.be/SpFFJ3krD0w

⑯ 심성보(공주대학교 공업화학전공학과)



지난달인 3 월 13 일에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 선포식이 있던 것을 아시나요?

한국 전쟁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에 집중하여서 단기간에 전례 없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에 맞지 않은 시민 의식으로 인해 오늘날의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행동규범과 배려와 나눔의 덕목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3 월 27 일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는 제 8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 종교계 인사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는 공동체 의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으로 질서, 나눔, 배려를 강조하였으며, '법률의 힘에 의한 강제적인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는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화의 방안은, 비록 시간이 걸리고 성취가 불확실한 면이 있더라도, 도덕성의 향상에 의하여, 결국에는 교육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성빈 장신대 교수님은 '이 시대의 개인들에게 종교공동체들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도록 돕는 매개체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기초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종교의 역할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남 미황사의 금강 스님은 '각 종교단체들이 집단의 이익을 접고 올바름으로 향하는 본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와 '언론과 방송에서 오락이나 사건사고의 기사들보다 감사와 배려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준규 가톨릭대 교수님은 '가정에서 진정 사랑의 관점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반성해야 한다.'와 ' 가정의 불행은 조건부 사랑에 있다고 본다.'를 언급하면서 가정이 지녀야 하는 사랑과 '학교는 공부에서 배움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학교교육의 변화를 말했습니다.

박상원 서울예술대 교수님은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인간이 되라.'이고, 진정한 스타가 되기 위해 인간이 되는 것을 강조한다.'와 '공동체의식을 키우기 위해선 사회의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연수 고려대 교수님은 '공동체 의식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공동체적 가치를 세우고 규범화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습득시키고, 이를 어길 때는 수치를 느끼게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제재를 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각 종교계 인사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공동체 의식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공동체 의식의 폐해를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많은 분들이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지하철'입니다.

어느 샌가 '지옥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지옥으로 묘사 될 만큼 많은 이들이 꺼리고 있지만 집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 '지옥철'을 타는데 지옥철을 타고 있으면 많은 이들의 몸이 부딪치면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서있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덥고 공기 또한 탁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곤 합니다.



지옥철은 우리나라 공동체 의식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해결 방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배려와 질서를 배운 것이 아니라 이익 추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먼저 변화해서 변화를 일으켜야합니다. 대학생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안으로 대학교와 기업이 협력하여 배려, 나눔, 질서라는 세 가지 덕목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외활동으로 재능에 따른 멘토링이나 봉사 활동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수에 비해 프로그램의 수는 적고 어느새 부턴가 진정으로 멘토링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스펙을 위해 하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재의 대외활동을 조금만 변형시켜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 이론을 배우고 실험을 할 뿐 제대로 회사에 취업을 해서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인턴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4 학년 1 학기 마치고 인턴을 지원해서 학교생활이 거의 끝나는 4 학년이 되서야 제대로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됩니다.

즉 기업은 기업 업무에 맞는 대학교의 학과와 협력을 해서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배려, 질서, 나눔 등을 배울 수 있는 현존하는 봉사활동,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종류의 대외 활동 프로그램은 캠페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캠페인을 병행하는 것은 현존하는 대외 활동 프로그램의 일정에 간단하게 공동체 의식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추가하면 되는 것으로 간단합니다.


기업과 대학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캠페인을 해야할지 '지옥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공동체 의식을 알리는 피켓을 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질서, 배려, 나눔은 공동체 의식의 기초이다.', '나의 이기심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 '남부터가 아닌 나부터 실천하자.', '지옥철을 만드는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등의 문구를 피켓에 넣습니다.

둘째, 제작한 피켓과 함께 전철역으로 갑니다. 전철역 밖에서 하는 활동과 전철역 안에서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전철역 밖에서는 흔한 캠페인으로 피켓을 들고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철역 안에서는 지하철을 타는 스크린도어 옆에서 직접 '지옥철'의 발생을 막는 활동 하는 것입니다. 전철역 직원이 아니라서 강력하게 재제를 할 수는 없으나 어느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업을 대표하는 마크가 새겨진 조끼나 단체 유니폼을 입고 한다면 캠페인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기업의 이미지도 향상될 것 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진 대학생을 기업에서는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기업에서 불만이였던 '대학생들은 과다 스펙이지만 회사에 맞는 인재가 없다.'는 이러한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직무 체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키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배려, 질서, 나눔이라는 덕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학생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나라의 자원입니다. 현재 선진국의 문턱에서 발목 잡혀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과제 중의 하나가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입니다.

바로 기업과 대학교가 협력한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를 확산시키는 전략은 어떨까요?

⑰ 장윤석(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들여다 보면 격려보다는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려 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개인주의사회, 물질만능, 상호비방의 경쟁의 시대로 이웃 간에 화목이라든가 신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갈등지수는 인종갈등을 겪는 터키 다음으로 2 번째의 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비용은 최소 82 조 원에서 최대 246 조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 간 갈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갈등은 나아가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36 개 비교 국가 중 35 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공동체 의식 없이 개인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는 가장 큰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공동체 의식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83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공동체의식(나눔, 배려 등)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님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3 가지로 나누어 공동체의식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정교육의 경우에는 부모의 중요성, 학교교육의 경우에는 교사의 중요성, 사회교육의 경우에는 언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임성빈 장신대 교수(기독교와 문화)님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러한 세 주체가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선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강스님(미황사 주지, 조계종 교육아사리)은 늘 올바름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중요성, 종교단체들의 올바름을 향한 역할, 언론은 감사와 배려의 함양, 치유프로그램보다는 치유이전의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박상원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님(방송인)은 제자들에게 가장먼저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면서 공동체 사회를 위해 부모나 사회의 선배, 지도자들의 질서, 나눔, 배려를 통한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고 자원봉사 등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변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박연수 고려대 교수님(특별위원회 위원)은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는 캠페인만으로는 안되고, 요람으로부터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83 차 월례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 중 교육 통한 공동체 의식 실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TV 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공동체 의식을 지키는 기사보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폭행, 쓰레기 불법투기 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린 시절 저 또한 층간 소음으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과 얼굴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아래층엔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있었고 저는 뛰어 놀기 좋아하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래층의 학부모는 참다 못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거듭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는 “우리 집인데 왜 조용히 해야 돼?”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렸고 생각없는 초등학생이었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제가 뛰거나 소란을 피울 때마다 주의를 주었고 이웃 간에 예절 교육을 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웃 간에 예절을 주제로 한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의식 교육이 없었다면 지금도 주변사람보다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파급력, 미디어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언론을 통한 교육 중 언론을 통한 교육이 가장 파급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미디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미디어를 통해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디어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TV 에 나오는 스타들은 공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V 에서 나오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연예인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따라 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박상원 교수님의 연기를 전공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은 이를 인지하고 행동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의 행동 하나 하나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실제로 주변 지인들을 보더라도 tv 에 차고 나왔던 가방, 신발, 지갑들이 이슈가 되면서 따라서 구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만큼 사회의 명사나 공인의 신분에 서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자들의 마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이 좋지 못한 소재를 갖고 제작을 하게 된다면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제작하는 사람들도 공동체의식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젠틀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젠틀맨이라는 프로그램은 배려와 존중이 숨쉬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일깨운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젠틀맨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에는 SNS 에 동영상들이 올라오면서 한 주의 이슈가 되곤 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난 후 SNS 에는 수많은 댓글 들이 달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SNS 유저들은 공동체 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예전 MBC 에서 방영되었던 양심 냉장고도 공동체의식을 일깨워 주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젠틀맨의 경우에는 케이블 프로그램이다 보니 많은 시청자를 끌어 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능이라는 이유로 재미를 주기 위해 연출된 상황들이 다소 자극적인 부분들이 있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건 몰래카메라, 상황극이라는 걸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억지로 상황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을 한다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공중파에서 공동체의식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논리적인 글보다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sns 의 중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sns 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에 공동체 의식에 관련된 자료나 영상을 많이 노출 시킨다면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에 공동체 의식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다 쉽게 공동체의식에 다가갈 수 있고 공동체의식을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식에 관련된 예산 낭비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줄어들을 것입니다. 나아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건설됨으로써 선진화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⑱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얼마 전 뉴스를 통해 10 대 청소년이 50 대나 60 대 이상의 고령층보다 돈과 권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연구를 시행한 한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는 세속적 가치를 상징하는 돈과 권력에 대한 10 대의 욕망이 할아버지 세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디지털세대가 매우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과정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공익의식, 희생과 봉사정신 같은 인간적인 가치들보다 개인의 부의 축적과 출세에 대한 욕망이 더 우선시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며 양적 측면의 확대를 이루어 왔을지 몰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출세에 대한 열망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모두 가져야 한다는

무한 경쟁의식, 그리고 내가 먼저 식의 이기주의와 약삭빠름이 우리 사회를 압도하는 가치들로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 선진화된 민주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 물질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가치 즉, 나눔과 배려 등의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나가는 것은 우리시대의 사명이자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선진화포럼 3 월 월례토론회에서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란 주제를 놓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선진화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종교계 인사 등 여러 토론자를 패널로 모시고 고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자들은 공동체 의식의 확립은 더 이상 이론의 문제가 아닌 습득과 체화의 문제이며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눔과 배려 같은 인간적인 가치들은 주입하거나 강요한다고 습득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공동체의식의 확립을 위해서는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착한 마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현장을 정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스탈로치의 위대한 결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사랑의 교육자이자 빈민교육의 아버지로 알려진 페스탈로치의 일화는 사람의 '환경'과 '계기'의 중요성을 일러줍니다.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써 페스탈로치의 양육과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가정부 바벨리(Babeli)였습니다. 그가 저술한 여러 교육소설 중에는 바벨리를 모델로 해서 모성의 위대한 교육적 힘을 찬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는 '한 미천한 여인이 죽을 때까지 평생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빈민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자'는 것이 자기 평생에 교육적 노력의 원천이었다고 술회하였습니다.

낮은 신분의 한 여인에게서 나타난 위대한 인간의 힘이 페스탈로치에게 인간성에 대한 위대한 체험을 하게 만들었고 일생에 걸쳐서 빈민아동을 위한 교육에 헌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빈민교육을 위한 그의 위대한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친 또 한 사람은 시골목사였던 그의 조부였습니다. 그의 조부는 그에게 농민들의 궁핍한 삶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권유하며 그 당시 편견에 찬 학교교육

때문에 농촌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보여주었고 그 계기를 통해 그는 빈민교육의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페스탈로치의 일화를 살펴보며 개인 속에 내재된 선한 결심과 능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우리의 교육환경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환경'과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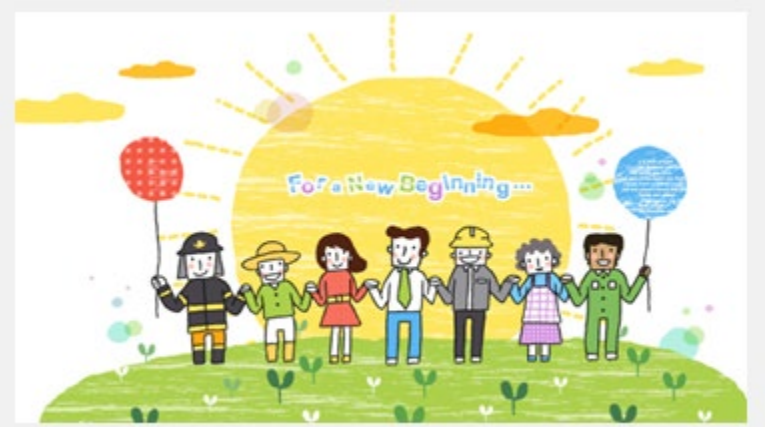


2016 년부터는 중학교 교과과정에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됩니다. 자유학기제란 한 학기를 시험 부담 없이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편성하여 교과과정을 유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개인의 적성을 찾기 위한 체험도 좋지만 인성교육을 위한 활동도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활동을 필수적으로 운영하여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신이 가진 작은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욕심을 위해 공부하던 아이들이 우리 이웃과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더 큰 비전과 꿈을 갖고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희망적일까요?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름답고 선한 자질들을 끄집어 내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현장, 대의를 꿈꾸게 하는 영감을 주는 교육현장이 가정과 학교에 잘 실현되어질 때,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의 자질들을 정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⑲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어 상생의 자세가 요구된다.

향약, 두레라는 공동체적 의식으로 세계에 유례없는 단기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에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 문제로 거론된다는 사실은 압축 성장으로 효율, 성과에 사회적 관심이 쏠려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2013년 서울, 경기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동일 기관에서 같은 문항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2005년보다 무려 15%P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없던 반사회적 동기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저하된 원인 규명을 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 변호사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질서, 나눔, 배려 3덕목을 교육하는 일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미황사 주지인 금강스님은 나, 개인이라는 이기심, 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적 사고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사회 구성원들이 자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 가운데 금강스님이 주장하신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공동체의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잠재되어 있으며 발휘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례들을 언론에서 활발하게 보도하는 것입니다.

과거 새마을 운동과 이를 통한 한강의 기적 달성에서부터 5천만 국민이 월드컵 응원으로 일심단결이 되어 광화문 일대에 군중에 가까운 인파가 모여도 질서 정연하게 행동하여 보여준 선진 시민의식 등이 그 예입니다.

무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각종 사기, 범죄 등의 뉴스가 만연한 최근 뉴스 보도에 이러한 공동체 의식 회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희망적인 사례들이 주기적으로 보도되고 이를 통해 감명을 받은 특정 시민이 공동체 의식을 솔선수범한다면 이것이 씨앗이 되어 실천이 점차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행위가 어떤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으며 결국 이기적인 행위의 가해자에게까지 피해가 돌아오는가에 대해 언론에서 칼럼, 기획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갤럽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 가지지 못한 사회 약자들이 여기서 느끼는 좌절과 고통을 가정에서 폭력 등으로 해소할 경우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여기서 느낀 스트레스를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어 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개인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서 발생한 사회 양극화로 인해 여러 가지 범죄가 늘어나면 피해는 구성원 전체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위는 부정적인 사회적 파급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체 의식 부활을 위한 해결책으로 금강 스님이 주장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한 방안을 언론 보도라는 수단을 통해 논의했습니다.

구성원들이 단편적으로 개개인의 사적 이익 극대화에 매몰되지 않고 행위 하나 하나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속성을 잘 이해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국가 선진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적 가르침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⑳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공동체의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언젠가부터 '우리' 가 아닌 '나' 를 위주로 살아가면서 이웃 간의 정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상대의 사소한 호의조차 의심해야 하는 딱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눔과 배려, 즉 공동체의식이 부족은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3월 27일에 있었던 월례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임성빈 목사님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세대 간의 깊이 있는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금강스님은 언론과 방송에서 오락이나 사건사고의 기사보다 감사와 배려를 느끼게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준규 신부님은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작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박상원 교수님은 나눔과 배려, 질서준수는 모두가 win-win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식의 선진화에 앞장서야 할 언론의 현 세태와 앞으로 언론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는 문전박대 당하는 '이사 떡 문화' 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사 떡 문화' 는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세시풍속 중 하나로서, 예부터 떡을 통해 공동체 간의 정을 느끼고 소통을 이어가게 하는 고유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삭막해져 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요즘, 이러한 '이사 떡 문화' 는 이웃간의 정과 소통의 수단이 되기는커녕, 문전박대 당하는 이사 떡에 대한 보도를 통해 이웃간의 소통이 단절된 현 세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비뚤어져가는 세태 속에서 체념한 듯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요즘 언론의 주요 뉴스에는 희망차고 따뜻한 사회보단 점점 더 삭막해지고 고단해져 가는 사회의 모습이 자주 비추어지면서 국민들은 비뚤어져 가는 세태 속에서 체념하듯 살아가고 있는데요.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우리 사회 속에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세상이 차가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뿐일까요?

국민들에게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은 가히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는 미디어의 노력이 우리사회의 결여된 공동체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언론은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닌, 삐뚤어진 세태에 대한 고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언론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언론은 꺼져가는 인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매개체로의 역할이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사건, 사고들로 가득한 뉴스로 인해 얼굴에 웃음꽃필 날이 줄어들면서, 따뜻했던 사람 사이의 정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꺼져가는 인정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해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팍팍해져 가더라도 아직은 우리 사회에 온정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늘한 기운만이 감도는 세태를 고발하는 보도보다는 작은 인정의 불씨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도함으로써, 어두워져 가는 사회를 보듬어 주는 따뜻한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즘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게스트의 사생활 폭로나 억지웃음을 유발하는 개그프로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모성 짙은 예능 프로그램 대신, 감사와 배려를 다시금 느낄 수 있게 감성을 자극하는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나 법질서 준수 생활화를 권장하여 무뎌져 가던 공동체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려는 언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따라서 나눔과 배려, 감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낌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지나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공동체의식 선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다.

따라서 나눔과 배려가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잡아주고,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래도 살아갈만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삭막한 사회 속에서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요?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정복경(윤리교육4), 김진섭 (윤리교육4), 안병욱 (윤리교육4), 이성문 (윤리교육4), 석신호 (윤리교육4)

이성문(윤리교육 4) :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3 월 27 일 개최한 제 83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보다 보편화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체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교육학자 '콜버그'가 제안한 도덕교육법인 '정의공동체' 이론을 활용하여 교실 안에 하나의 소(小) 사회를 만들어 일주일에 1~2 번씩 사회적 이슈, 도덕적 가치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즉, 학습자들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몸에 체득하게 되고, 도덕적 주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숙고를 겸하게 되어 바람직한 가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작은 사회 안에서 각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의식 즉,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레 깨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안병욱(윤리교육 4) :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현재 학교의 현실과 관련 지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도덕, 윤리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다소 제한적인 여건이 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는 다르게 본다면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와 같은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고, 학교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칼럼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1~2 시간을 배당하여 민주공동체 교육법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과 간에 편향적으로 적용되는 정책들 같은 경우는 개정되어야 하고, 이상적인 교육법이 시행, 적용된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실재하는 현실을 고려해봤을 때 이러한 교육방법은 이뤄지기도 어렵고, 학생들에게도 양적으로나 심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도덕, 윤리교과에서 진행되는 '이론' 수업 안에서 공동체 의식과 관련한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과서에서 공동체의식과 관련한 이론적 내용 자체도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서 이론수업을 더 충실하게 진행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도덕교과서에서 '다문화 가정과 그 구성원'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통합적 인식을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의 작은 챕터로 다뤄지고 있고, 내용도 부실한 것을 보면 도덕, 윤리 수업의 기본이 되는 이론적 내용에서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것이 우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민주공동체와 같은 행동적 방법이 우선시되는 교육을 하더라도 활동에 담겨 있는 본 뜻을 이해하거나 온전히 체득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육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간 민주공동체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정복경(윤리교육 4) : 저는 오히려 민주공동체 교육방법에 찬성합니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인지적인 발달이 더 진행되었으며 사회화가 더 이루어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을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습자의 경우 그와 같은 토론식 수업에 맞지 않는 수준의 발달단계에 있으므로, 수업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시간 단위를 30 분으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안병욱 학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고등학교보다 이론교육에 비중을 더 주는 방법으로 공동체 의식함양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신호(윤리교육 4) : 만약에 민주공동체 방안을 진행하게 된다면,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사회화가 거의 진행된 성년에 비해 완숙하지 않은 발달의 수준을 가진 학교의 학습자들의 손에만 도덕적 결정과 소규모 공동체의 운영을 맡겨둘 경우, '장난'과 같은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수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덕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개입하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으로만 오롯이 판단을 맡긴다면, '가치명료화'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즉, 배려, 나눔과 같은 도덕적 가치가 아닌 돈, 욕망, 쾌락과 같은 비도덕적 가치에 비중을 두게될 수도 있어, 자칫 공동체 의식 고취라는 본 목적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advisor 로서 학습자들의 결정이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운영하기에 앞서 대전제로서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지향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가치(예를 들어, 배려, 나눔, 준법정신, 인간존중)를 도출하여 이 가치들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김진섭(윤리교육 4) : 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기에 앞서 현재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에 대한 숙고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주 거론되는 비판이긴 하지만, 현재의 학교교육은 다분히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교육 자체의 성격이 '기능적', '실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성문 학우께서 칼럼에서도 쓰신 것처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자는 말, 그리고 분위기와는 별개로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육정책이 서로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복경(윤리교육 4) : 제가 이번에 교생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교생실습을 나가기 전에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집중이수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집중이수제는 교과목을 '군'으로 분류하여 수업시간만 배당하면 몰아서 어느 시기에든 해당 교과의 교육시점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목적은 부담되는 교과목 수를 줄이고, 집중적으로 심화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질되어 도덕, 사회, 체육, 미술과 같은 통칭 비주류교과의 경우 국영수 교과에 밀려 홀대 당해 특정 학기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밀려서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토론의 주제인 '공동체의식' 같은 경우 해당 개념이 그 안에 도덕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도덕, 윤리'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한데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학습자들에게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김진섭(윤리교육 4) : 윤리, 도덕과 교육의 특성상 여타 수학과 같은 기능교과와 달리 교육을 받은 당사자가 곧바로 능력, 행동의 변화가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면자효과(sleeper effect) - 긴 시간을 두고 잠재되어 있다가 학습자의 변화가 나타나는 특성 -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수제를 활용하여 특정 시점에 몰아치기 식으로 도덕, 윤리교과를 배당한 후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함양

이성문(윤리교육 4) : 도덕, 윤리과에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교육적 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론수업을

통해 '공동체'과 관련한 도덕적 내용을 보충하고 강화하는 형식으로 의식의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민주공동체 방안을 찬성하되 학습자의 수준, 교사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구체적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서,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이 국영수 위주의 편중된 교육이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더욱이 '집중이수제'와 같은 특정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상황적 조건을 먼저 짚어보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의식교육'의 방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유의하거나 유념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병욱(윤리교육 4) : '공동체' 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덕교육'에 있어서는 크게 개개인의 인지적 발달을 촉구하면서 의미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이 속한 사회와 연계 지어 '사회화'를 염두에 둔 가치들을 학습자에게 전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옳은 개인과 좋은 시민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향 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공동체의식교육의 경우 좋은 시민을 만드는 경향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이 속한 사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그 사회가 바라는 가치들이 전수되고 주입되어, 자기구성과 비판 없이 수동적으로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다수의 소수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집단에 매몰되어 그 사회가 바라는 특정한 방향으로 경도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극단적으로 간다면 일종의 '사상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점을 염두에 두고 공동체 의식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되, 학습자가 비판적 시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자 자신도 편향된 시각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석신호(윤리교육 4) : 역사적인 사례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45 년 패전하기 전까지 군국주의에 의거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이때 일본인들의 정신적 기반이 된 교육이 '수신(修身)'과목, 오늘날의 도덕이라 할 수 있는 과목을 통한 교육이었습니다.

수신과목을 통해 군국주의 일본은 국가에 대한 무제한적인 충성과 희생정신, 전체주의적인 도덕, 윤리관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침략과 폭력을 정당화하였으며 그 속에서 개인은 국가를 위한 하나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패전 후 수신교과목은 폐지되고 사회과 공민교육으로 대체되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의식' 교육이 절대적으로 유념해야 할 방향, 나아가서는 안 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문(윤리교육 4) :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족한 '공동체의식'을 대주제로 하여 교육적 방법을 통해서 특히 '도덕, 윤리과'의 입장에서 실재적으로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국영수중심의 기능적 교육경향에서 벗어나 공동체의식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실재적인 방법으로는 기존의 이론적 내용을 보충하여 공동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과 '민주공동체'라는 별개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방안이 등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공동체교육'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 즉, 일방적 사상교육으로의 왜곡, 변질 가능성을 항상 경계하면서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서연우, 김동하, 임형윤 (사진:권인성)

서연우 (고대국제 3): 고려대학교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 월 27 일 한국선진화포럼의 주최로 "공동체의식(나눔, 배려 등)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83 차 월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에는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 뒤 임성빈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와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상원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삼승 변호사는 질서준수는 남의 평안을 해치지 않는 것이며, 남도 그렇게 해줌으로써 나의 평안도 보장받는 반대급부가 따라온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공동체적 가치의 형성, 이상적인 집단 모델의 발굴, 지속적인 교육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쓴 칼럼을 보내드렸는데, 공동체의식에서 무엇보다도 질서준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벌금제도, 공익 광고 및 캠페인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고 썼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월례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이나 제 칼럼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한 분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성 (고대국제 2): 저도 양삼승 변호사가 말씀하신 교육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기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체득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공동체의식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교에서 하루에 버스자리 한 번 양보하기과 같이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작은 과제를 하나씩 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공익 광고나 국가 캠페인에 의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하 (고대국제 3): 저는 약간 서연우 학우와 의견과 다른데요. 저는 질서준수는 나눔과 배려라는 덕목에 대해 사람들이 먼저 알고,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알아서 질서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양삼승 변호사가 강조한 교육도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이미 어느 정도 확고히 자리잡은 현 세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입니다.

서연우 (고대국제 3): 저는 나눔과 배려라는 덕목이 질서준수보다 선행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나눔과 배려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 내에 질서가 확립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제학에서처럼 수요와 공급이 균형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가격을 형성했을 경우,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며 그만큼 사회적 후생이 떨어집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우선시되며, 남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나눔과 배려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임형윤 (고대국제 3): 저는 서연우 학우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질서준수가 먼저 선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눔과 배려라는 덕목들이 가치로서는 질서준수보다는 조금 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단계로 들어서는 것처럼, 이 나눔과 배려라는 덕목들이 바로 익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명문화된 혹은 관습으로 있는 규칙들을 지키는 연습이 선행되어야 하고, 충분한 연습 후 나눔과 배려라는 덕목들이 사회 전체에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얼마 전부터 시행된 금연법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제도도 벌금제도로 시작되었지만, 단순한 벌금제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의식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학교 근처에서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확연히 많이 줄었고요. 이처럼, 벌금제도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우 (고대국제 3): 시작부터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단순한 지식전달의 교육이 아닌 체득화하는 교육, 나눔과 배려가 질서준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질서를 지키고 난 후에 나눔과 배려의 덕목들이 실천이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약간 초점을 변경해서, 저의 칼럼에서 강조했던 질서준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도 질서준수를 위해 학교와 사회 내에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기사나 요즘 빈번하게 사회 내에서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들이 사회에 존재하는 규범이나 규칙과 상이한 가치관과 충돌하여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규칙은 지켜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

임형윤 (고대국제 3): 제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유는 상이한 가치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요인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요소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규칙이라는 것은 지켜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만드는 입법부도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규칙들에 대해 동의한 것이고,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인성 (고대국제 2): 저는 질서를 맹목적으로 지킨다기보다 보다 많은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특정 규칙이나 질서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떤 법이나 규칙이 제정되었을 때, 이에 관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인 '법과 사회'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이 어떠한 근거를 만들어졌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질서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해진 규칙이라면, 이 배려에 대한 교육이 질서준수 만큼 강조되어야 합니다.

서연우 (고대국제 3):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상이한 가치관, 규칙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맹목적인 준수와 어느 특정 요인으로 단정짓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같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들을 규제하는 방법 중에 교육 외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임형윤 (고대국제 3): 저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안의 노약자석을 노약자나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놓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얼마 전부터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이처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하나의 관습법처럼 하나의 규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수들이 지키는 규칙들이 이것을 원래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도 따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하철도 국가적인 캠페인을 통해 개선된 것과 같이 정부가 전국적으로 포스터, 미디어, 학교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이를 널리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구속력에서도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반에서나 꼴등이 있듯이, 어느 사회에나 마찬가지로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는 에러처럼 예외의 경우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 방법이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동하 (고대국제 3):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합의 하의 규칙들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강제성을 지니며, 올바른 행동을 촉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인성 (고대국제 2): 저는 임형윤 학우의 의견의 마지막 부분에 다소 의문이 드는데요. 아무리 통계의 에러처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법이든 눈치로든 지적을 하고 고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의 경우, 자신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끔 본인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면, 이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실생활에서 이러한 지적을 용감하게 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한다면 국민들의 행동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우 (고대국제 3):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교육을 통해 어떻게 보면 다수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 사회 내의 구성원들 간에 사회적 구속력을 형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구성원 간의 합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해결책들이나 방법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10 년이나 20 년 안에 이것들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990 년 중후반만 해도 지하철 승강장에서 담배를 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승강장은 물론, 술집에서도 금연이 실시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따르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동하 (고대국제 3): 저도 동감합니다. 서연우 학우가 썼던 칼럼에서처럼 벌금제도나 캠페인을 통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10 년에서 20 년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대다수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인성 (고대국제 2):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다소 우려되는 것은 너무 급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시작한 목적과 다른 형태로 행동들이 변질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제한이나 구간을 두기보다는 천천히 고칠 수 있는 부분들부터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형윤 (고대국제 3): 저는 사실 두 분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데요. 사실, 인식 개선이라는 문제 자체가 고려해야 할 변수나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급격한 경제 침체기로 들어가 국민들의 생활 스트레스가 급증해도 이것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들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넉넉한 타임 프레임을 두되 조금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서연우 학우가 말했던 제도들이나 다른 수단들을 동원하여 빨리 해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서연우 (고대국제 3):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단기간에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입장과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해결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생각의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이 나타나는 원인, 이에 대한 해결책과 이러한 해결책들이 언제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았고, 이로써 제 83 차 월례토론회를 바탕으로 한 2 차 고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천세원, 유성렬, 오상택, 임종효, 정원석, 김영은

정원석(연대시생 4) :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선진화 연구모임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니라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3 월 월례토론회는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공동체 의식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동쪽에 있는 예의가 바른 나라라고 해서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고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웃어른 공경이나 이웃들 간의 배려와 나눔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두레나 품앗이 등 힘든 일은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 나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를 통한 세계 15 위의 경제 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동체 의식은 더 성장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서, 나눔, 배려 등 공동체 의식이 선행되어야지만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분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나눔, 배려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박연수 교수님께서는 공동체 의식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현대사회의 필수요소로 공동체 의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아직도 변화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학생들이 조별과제를 할 때에 서로를 도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개인 과제를 먼저 해결하고 조별과제는 다른 사람이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도서관에서 자리를 사석화하여 순환적으로 도서관 자리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보면 공동체 의식이 많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에 의식에 관한 문제는 어린 시절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서로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동체의식을 가르쳐야 하는 도덕과목에서도 경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 교육이 공동체 의식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공동체 의식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성렬 (연대생공 석사) : 저는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이 옛날보다는 낮아졌지만 미래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TV 를 보다 보면 유니세프 등 자선단체들이 후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율은 낮지만 이러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가 밝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제력은 성장했지만 낮아진 공동체 의식

오상택 (연대사회 석사) : 실제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성장을 통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쁜 사회에서 서로를 챙기기보다 자신만을 생각하도록 공동체 의식은 낮아졌습니다. 사회는 경쟁사회로 바뀌었고 자신이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남들에게 밀려 도태되게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의 모습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은 (연대 교회음악 3) : 저는 외국 합창대회를 나갔을 때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외국팀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보다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는데 비결은 자신이 노래를 잘 부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주위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성악과에 합격할 만큼 노래를 잘하지만 그 단체 안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뽑내는 것이 아닌 주위의 목소리에 맞추어서 소리를 내 주는 것이 공동체 의식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천세원 (연대 생명공학과 4) : 맞습니다. 저는 작년 서울시 자원봉사자 나눔 축제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눈 사랑은 언젠가 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모인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원석 (연대시생 4) :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의 현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종효(연대 생화학 석사) : 저도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 고등학교 도덕교육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느끼는 것이지만 공동체의식을 가르쳐야 할 과목인 도덕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배운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라는 행동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도덕 같은 과목일수록 이 비율을 높여서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은 (연대 교회음악 3) : 그리고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조별로 점수를 얻는 활동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와서 조별과제를 처음 접하게 되지만 외국은 어려서부터 그러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서로 협동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어려서부터 많이 접하게 된다면 공동체가 힘을 합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어릴 때 겪은 시행착오는 대학생 성인이 되었을 때 행동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상택 (연대 사회학과 석사) :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지역의 여러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확실한 벌을 주어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지시키고 남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직접 보여주어야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앞으로도 아이가 똑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교육도 중요합니다.

정원석 (연대시생 4) :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동체 의식의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점을 토론해 보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도 많지만 종종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낮추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도덕교육을 행동으로 평가하는 방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조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지역 공동체를 통한 가정교육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위의 해결방안은 대학생들이 제시한 것이지만 가장 최근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더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예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나아가는 대한민국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는 것처럼 공동체 의식도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 모두에게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선진화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④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서영채 공현덕 신다정 김영재 유승호 박제진 (경영)

공현덕(경영 3): 두 번째 삼육대학교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문은 다 미리 보고 오셨죠? 이번 월례토론회 주제는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월례토론회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학업에 열중하시느라 참여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같이 참여하기로 해요.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지난 3 월 27 일 개최한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공동체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발제자로 토론회에 참여한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는 “공동체 의식의 대표적 덕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질서준수”라며 “나눔과 배려의 덕목은 ‘남에게 베푼다’는 의미가 강한데 반해 질서준수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의 최소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토론 해보기로 해요.

공현덕(경영 3): 가정교육을 통해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칼럼을 작성했는데요, 이것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가정교육’에 있어서 어떤 방안을 통해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제진 (경영 3): 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안 버리고, 윗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아이도 분명 그 부모의 좋은 모습을 따라 하게될 것입니다.

공현덕 (경영 3): 네, 나눔, 배려, 질서의 공동체의식 중 저는 질서 준수에 관한 가정교육 측면에서 칼럼을 작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 한 번 얘기해 볼까요?

박제진 (경영 3): 교육이죠, 교육은 장기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교육이 답인 것 같습니다.

김영재(경영 3): 의무적으로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수련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요?

유승호 (경영 3): 네 맞습니다. 우리 학교의 MVP 캠프와 같은 인성교육, 공동체의식 함양이 목적인 캠프를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공현덕 (경영 3): 맞아요. 우리 삼육대학교는 입학자 합격 발표 후 첫 학기 개강 전에 학교에서 주관하는 ‘MVP 캠프’를 3 박 4 일로 열어서 학교 기숙사에서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 동안 많은 명사들, 그리고 선후배 간의, 그리고 교수님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서로 친분을 쌓아가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대한 포부를 다지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이 삼육대학교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3 박 4 일 간의 MVP 캠프를 통해 학교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제 스스로가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삼육대학교가 종교의 색이 강해서 종교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캠프를 진행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선배들과 이런 저런 얘기도 나누고, 미션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아갈 때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육대학교 MVP캠프 오프닝 퍼포먼스

신다정 (경영 4): 맞습니다. 우리 학교의 MVP 캠프와 같은 공동체 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캠프를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에도 접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텐데요, 수학 여행은 이미 친해진 친구들이랑 그저 놀러 간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MVP 캠프는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 교수님들까지 전부 다 아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질서 있게 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효과적으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현덕 (경영 3) : 네 입학하기 전부터 공동체 의식과 인성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교육해주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학교가 항상 인성 교육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시고, 또 여러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M6ZvcBs0nVA

⑤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김민균,김원아,서동진,심영섭,천종욱,이소연

김민균(신방 4) : 두 번째 광운/고려/건국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미리 토론 발제문과 초청장, 그리고 칼럼을 보내드려서 아시다시피 지난 3 월 27 일,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변호사, 교수님 그리고 종교계 인사분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는 머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닌 가슴에 호소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해야 하며, 임성빈 교수님은 사회의 다양한 종교공동체와 가정, 학교, 언론들은 앞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도록 돕는 매개체 등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연수 고려대 교수는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규범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박상원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는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교육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은 각 종교단체들이 집단의 이익을 접고, 올바름으로 향하는 본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덧붙여 언론과 방송에서 오락이나 사건사고보다 감사와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눔과 배려 그리고 준법과 질서라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는 문화적 선진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 혼자만 잘되면 남은 상관없다는 식 혹은 배려를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막연한 개인 이기주의 사고가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배려〉의 정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배려의 실천이 곧, 공동체의 선진화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아(식생 4) : 저는 우선 배려의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원정출산들 아시죠?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상류층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편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직위는 그에 맞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바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섭(행정 4) : 저도 원정출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 전부터 상류층의 책임의식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천종욱(경영 4)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정출산이란 상위 1-2%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상위의 행동으로 인해 나머지 98%의 사기가 저하가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균(신방 4) : 좋습니다. 배려라는 범위는 좁게 본다면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본다면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제가 공동체 선진화인 만큼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요?

김원아(식생 4) : 얼마 전 '리더의 조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을 때, 인상적인 두 나라의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우루과이 대통령과 핀란드 전 대통령들. 이들은 자신의 월급의 90%를 사회에 환원하며,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 등의 사회적 직위에 따른 책임을 실천하였고, 저는 이러한 행동들이 진정한 의미의 〈배려〉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교육으로 우리의 <배려의 정신>을 키울 수 있다

이소연(사복 4) : 저는 이번에 〈배려〉라는 단어를 받았을 때,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때 어땠나요? 〈배려〉의 정신 혹은 〈인간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공부〉로 평가받지 않았나요?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로지 아이가 공부만 잘하는 것을 원하는 학교, 부모 모두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진(문헌 4) :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가정교육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대학 입시에서의 과목만을 중시할 뿐이지 도덕, 한자와 같은 인성과 연결될 수 있는 과목을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도덕과 한자와 같은 교과목들이 바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 중심인지, '남'이 중심인지에 따라 <배려>의 정신

이소연(사복 4) : 서동진 학우처럼 '배려'의 인식이 다른 하나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자동차의 전조등을 키는 경우에는 '내가 기다려줄 테니 너가 먼저 가렴'이라는 뜻이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가 먼저 갑니다'라는 의미로 쓰이지요. 초점이 '나'인지, '너'인지에 대한 그 사회의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천종욱(경영 4) : 저도 또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한 탓에 세대의 단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세대, 2 세대 그리고 우리

1 세대와의 교류와 대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이는 〈배려〉그리고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사회생활의 가장 기초,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김민균(신방 4) : 그렇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에서도 경제부분에서는 상위이지만, 사회통합/관용 부분에서는 30 위라는, 거의 '꼴찌'의 수준입니다. 윤리적 지식으로 도덕적 행동의 실천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지요. 앞서 학우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와 경제 발전으로 인해 무한경쟁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빈부격차는 커져만 가고, 예의와 염치 그리고 〈배려〉는 더 이상 중요도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조금 더 논의를 좁혀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현재의 〈배려〉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었는지 논의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육〉이라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 해보겠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배려의 실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서동진(문헌 4) : 저는 가정과 학교 언론 이 모두가 〈배려〉라는 것을 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였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세계인이 부러워할 칭호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보다는 나를 더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동방예의지국〉의 칭호가 붙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동방무례지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을까요? 가정교육도 '나'와 다르면 배척하는 문화가 아닌 인정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배려> 정신, 아직 교육으로부터 희망이 있다

심영섭(행정 4) :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보도를 받은 바로는 '동방무례지국'이다, '배려'가 없다고들 많이들 이야기 하는 것에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물론, 옛날보다 많이 변하기는 하였지만, 그리고 요즘 시대의 어른들이 옛날 어른이 아니기는 하지만 모두 다 '무례하다'라든가,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일반화가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아(식생 4)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배려〉의 정신이 부족하고, 가정교육/학교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의구심이 들지만, 생각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배려〉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았을 때, 이대로

방치를 하다가는 〈동방예의지국〉, 〈배려〉등의 정신이 소진될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종욱(경영 4) : 아까 서동진 학우의 말처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같이 살아갑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배려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의식, 개인은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인은 혼자 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배려〉는 선택사항이지만,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단절이 될 수도, 관계의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균(신방 4) : 좋습니다. 가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며,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이유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세대의 단절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배려〉라는 것이 선택사항이고, 법제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한 필수적이라는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서동진(문헌 4) : 공동체 의식이 줄어들고, 배려가 줄어드는 것. 이것은 모두 우리가 '개인주의'를 잘못 받아들여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은 무조건 낡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대화〉가 줄었다는 현상도 아마 이러한 것들을 가속화하는 요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른들과 대화하고, 가족의 어른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몸으로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를 위해서는, '개인주의'를 잘 못 받아들인 지금의 현실을 깨달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가정에서의 〈대화〉가 풍부해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연(사복 4) : 입시위주의 교육, 인성교육의 부족. 우리에게 항상 꼬리처럼 따라붙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려/상생/협동을 통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배려의 상대〉 같이 〈동행하는 상대〉라고 보면 어떨까요? 배려는 '손해'가 아닙니다. 배려하는 것을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는 또 다른 사회통합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선순환적인 구조로 인해 나에게도 도움이 되며,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배려를 하게 되면 자꾸 상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배려〉가 의식화되기 위해서는 서동진 학우의 '말'처럼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행정 4) : 살아있는 교육이 아닌 죽은 교육, 즉 적용이 되지 못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배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성에 대한 가치가 뒤로 밀려있습니다. 살에 닿는 〈배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가치는 사회의 가치이며, 사회의 가치는 교육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살에 닿는 배려와 살아있는 교육이 가장 먼저 실시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교육으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들도,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가정교육이 아동 및 청소년들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사람들, 우리들도 가정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가 가장 중요하지요.

김민균(신방 4) :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에 대해서, 〈배려〉라는 주제를 통해 문제/원인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안은 어떻게 할 지까지 토론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하여야 하는지까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교육이 좋은 교육이 되었을 때, 즉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 될 때, 그리고 우선순위의 가치가 〈배려〉가 될 때 우리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배려〉를 통해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하고, 그 대화로서 〈배려〉의 정신과 실천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의 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선진화 연구모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사진 2 : http://youtu.be/a80wlnWZd-E
사진 3 : http://youtu.be/F6cV_RRbeu4
사진 4 : http://youtu.be/SXf2PkJ9zis

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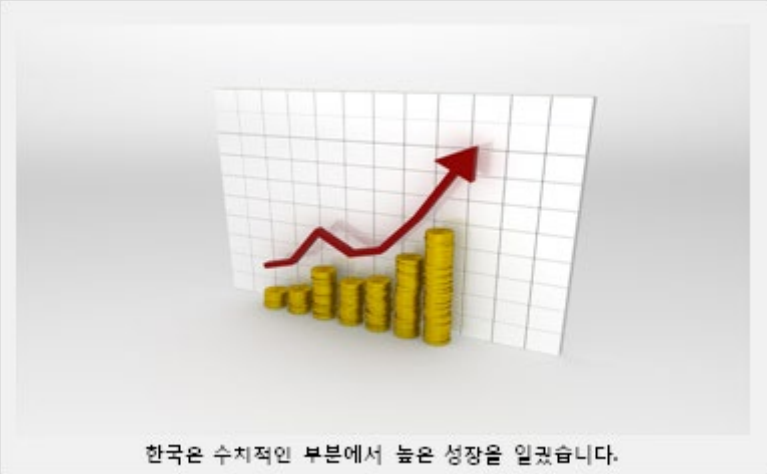


왼쪽부터 김수현, 현미란, 이예원, 백다혜, 김정아

김수현(성신 지리 3): 지금부터 성신여자대학교 제 2 차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연구모임은 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83 차 월례토론회 '공동체 의식(나눔, 배려 등)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 눈에 보이는 질적인 면에 있어 큰 성장을 일궈낸 사회입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부분에서의 큰 성장과 대조적으로 시민의식 차원에서는 그만큼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는 질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선진사회에 가깝지만 시민의식은 한참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성한 칼럼과 이번 83 차 월례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 부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번 월례토론회를 듣고 이익과 경쟁,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적인 현대 사회에서의 질서와 나눔, 배려에 대해 칼럼을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물질적 풍요는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입니다.

과열된 경쟁의식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나눔을,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은 무질서의 삶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이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와 가정에서의 생활 교육과 '역지사지'를 이야기하였는데요. 역지사지란 모두가 알고 있듯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역지사지 교육을 통해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어떨까?'와 같은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나눔과 배려, 질서의 의식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러한 나눔과 배려, 질서를 실천하였을 때 단순히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눔으로 인해 얻는 행복과 질서와 배려를 통해 불편함을 해결 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가진 공동체 의식의 문제점과 교육을 통한 해결책에 대하여 각자가 생각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다혜(성신 지리 3): 저는 배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저는 가끔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그게 굉장히 매너가 좋다는 것처럼 인식되는 모습 때문이예요.

사람들이 너무 배려가 없달까요? 사람들의 배려 의식이 점차 하향평준화가 되어가니까 이제는 평균만 해도 굉장히 배려가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거죠. 배려라는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예요. 그런데 그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과연 선진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를 지키는 것으로 한국이 선진 시민사회로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김수현 학생 말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학교 교육의 차원에서 실천될 수 있어요.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배려를 하는 마음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레 몸에 베인 배려 의식을 실천할 수 있겠지요.

김수현(성신 지리 3):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방식이 활용될 수 있을까요?

백다혜(성신 지리 3): 저는 대단한 교육을 의미 하는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배려의 부족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단순히 혼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닌 배려의 마음을 갖도록 선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이야기 하자면 전 어릴 적부터 오빠랑 자주 싸우곤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항상 그때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를 시키셨어요. 대부분의 싸움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야기되어 일어나곤 했거든요. 그럴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 되더라구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무슨 일을 할 때나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게 습관처럼 베어서 행동하게 되더라구요. 그 덕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게 되고 어릴 땐 그 칭찬이 좋아서 더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리하자면 어린 시절 가정과 학교에서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배려 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해주고, 배려있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으로 보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미란(성신 지리 3): 저도 백다혜 학생의 의견에 공감이에요. 요새는 정말 길을 가다가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을 겪는게 잦아진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다 생각해요. 배려가 없는 것과 소위 쿨한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안 줄 때 그것이 멋지고 자유로운, 쿨한 모습이 되는 것이지 그게 남들에게 피해를 줄 땐 배려가 없는거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편해지지 않을까요?

가정과 학교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저는 언론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요. 앞서 이야기한 양심냉장고 사건처럼 무언가 사람들이 크게 느끼는 사건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 배려 의식이 강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언론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언론의 힘이란 단순히 어린아이뿐 아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정아(성신 지리 3): 제가 얼마 전 여행을 다녀왔다가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경험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만 살다가 친구랑 같이 지방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니 참 질서 의식이 너무도 결여되어 있단 점을 느꼈어요.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내리고 타기, 한줄서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더라구요. 평소 서울 지하철에서 지켜지던 것들이 갑자기 변하니까 혼란스럽고 여간 불편한게 아니더라구요. 그때 새삼 질서라는게 내가 지키면 남도 편하고, 나도 편하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정착되고 나면 정말 편한 것 인데, 아직 우리 사회에 이러한 질서 의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구나 싶었죠.

공동체의식에서 남을 위하는 나눔과 배려도 중요하지만 전 기본적으로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질서 역시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확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보다는 '왜?'에 주목 하는거죠. 왜 질서를 지켜야 할까요? 그 부분에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교육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현재의 세태에 맞추는 것이죠. '나를 위해 지키는 질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질서를 지켰을 때 나 역시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질서를 지키는 행위가 결국은 나를 위한 행위임을 이야기 하는거죠.

또 교육과 더불어서 시민의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으로 규제를 하면 이전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지만 법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식도 필요한 것이죠.

서울 메트로에서 자주 나오는 지하철 에티켓 광고처럼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단에서 눈에 자주 띄게 질서 의식에 대해 언급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엔 스스로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강조하면 시민의식이 변화할 수 있어요.



공동체 의식의 시작, 가정과 학교의 교육에서부터

이예원(성신 심리 3):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현 학생이 선진화포럼에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며 작성한 칼럼 중에 '다들 김장하셨나요?'라는 글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는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눔의 정이야 말로 우리 선조들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아닌가 싶어요.

겨울에 먹을 김치를 담구며 주변 이웃, 친척들을 위해 좀 더 넉넉히 준비하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나눔의 정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최근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나눔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지 못한 채 팍팍한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나눔에 대한 미덕을 알려주고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가 예전처럼 나눔의 정을 지닌 사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나눔의 기쁨을 느끼게 해 준다면 사람들이 점차 나눔을 늘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으로는 저는 먼저 가정에서 김장문화와 같은 우리 나라의 나눔을 함양한 전통문화의 체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한데요. 학교 교육으로는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의 학교에서는 체험 활동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하던 의무적 봉사활동이 아닌 정말 나눔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봉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어떨까요?

김수현(성신 지리 3): 다들 공동체 의식인 나눔과 배려, 질서 의식에 대해, 또 교육으로의 해결책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백다혜 학생은 배려 의식에 관하여 이야기하여 주셨는데요. 최근 배려 의식의 하향평준화를 지적하여 주시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릴 적 경험을 바탕으로 역지사지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현미란 학생 또한 배려에 대하여 지작하여 주셨는데요. 해결책으로는 언론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양심냉장고 사건과 더불어 언론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아 학생이 여행 도중에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질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해결책으로 교육의 방향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질서를 왜 지켜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나를 위한 질서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예원 학생이 제가 예전에 쓴 칼럼을 바탕으로 나눔의 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가정에서의 전통문화 의식의 함양, 학교에서부터 의무적 봉사가 아닌 나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봉사를 통해 잃어버린 나눔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83 차 월례토론회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의 문제점에 대해 본인이 생각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예원(성신 심리 3): 저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사회의 안일한 의식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경제적인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개인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의 인식 자체가 배려와 나눔, 질서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현재의 사회에서 과연 어느 누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려 할 수 있을까요? 사회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공동체 의식의 재고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수현(성신 지리 3): 그렇다면 사회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예원(성신 심리 3):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김정아(성신 지리 3): 현재 한국 사회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이득을 얻기 위해 남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해도 상당히 무신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무신경이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 해도 좋다'가 아닌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지 알 수 없다'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남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바로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인거죠. 나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의 부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출근 길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하기'와 같이 주변 이웃들에 대한 작은 관심이 현 사회에 팽배한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백다혜(성신 지리 3): 전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내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층간소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면 아래 집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두가 알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바로 최근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 부재 현상의 원인이 아닐까요?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책임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국민이 바로 선진 시민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겠지요.

제가 말한 책임의식이란 내가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죠. 저는 교육을 통해 책임의식을 확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강조하고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책임에 대해서는 다소 독립적인 교육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임의 무게에 대해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책임지는, 독립적인 책임의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결정을 할 때 혹은 잘못을 하였을 때 주변 어른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현미란(성신 지리 3): 얼마 전 제가 인터넷을 하던 중 예전 TV 프로그램이었던 '양심 냉장고'에 관련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양심냉장고의 탄생 비화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정지선을 지키는,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에게 양심 냉장고를 선물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 촬영할 때 밤새 그 누구도 신호를 지키지 않다가 동이 틀 때쯤 한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 운전자가 장애인이었다는 이야기가 밝혀지며 다음날 신문에 '과연 누가 장애인인가.'에 대한 기사가 크게 실리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야기예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질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 사회가 이처럼 계속해서 질서의식이 결여된다면 과연 우리 나라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질서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 생각해요.

저는 '법'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법으로 규제하고 질서를 어겼을 때 불이익이 있다면, 사람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질서를 지키지 않을까요?

이예원(성신 심리 3): 저는 법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봐요. 법이라는 것이 강력하긴 하지만 삼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나요. 언제, 어디서나 법이 지켜보지 않는 이상 법이 지켜지리라 예상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단속을 할 때에만 정지선을 칼 같이 지키는 한국의 운전자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건 법뿐 아닌 사람들의 시민의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해야 해요.

김정아(성신 지리 3): 같은 생각이에요. 법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엔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질서를 지키는 것은 두 가지로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과 시민의식이죠. 법으로 규제를 하면 이전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지만 법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식도 필요한 것이죠.

서울 메트로에서 자주 나오는 지하철 에티켓 광고처럼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단에서 눈에 자주 띄게 질서 의식에 대해 언급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엔 스스로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강조하면 시민의식이 변화할 수 있어요.

김수현(성신 지리 3): 네. 네 분 모두 공동체 의식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셨는데요. 먼저 이예원 학생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안일한 의식과 이기주의를 문제점으로 꼽아주셨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언론을 통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아 학생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무관심을 문제점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주변 이웃들과의 작은 관심의 재고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백다혜 학생은 다른 의견으로 책임의식의 결여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독립적인 책임의식의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가 무언가 결정을 할 때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현미란 학생은 양심냉장고라는 이야기를 하며 질서 의식의 결여를 언급하였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법으로의 규제를 제시하여 주셨는데요. 다른 의견으로는 이예원 학생이 시민의식의 변화를, 김정아 학생이 질서를 지킴으로써 스스로에게 이득이 온다는 점과 법과 책임의식이 모두 갖춰져야 함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은 '공동체 의식(나눔, 배려 등)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되어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나눠주신 성신여대 학생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연구모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⑦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한지송, 김수연, 김희정, 문정인, 이혜지

김희정 (영문 2): 숙명여자대학교 두 번째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 월,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83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였는데요, 이를 위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단체와 교수님들께서 참여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미덕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약화된 우리 공동체의식을 오늘의 시점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준법정신을 강조하신 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종교단체가 이번 토론에 많이 참여한 만큼 종교단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한 교육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크게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미디어 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국민들에게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교직 이수 중에 있습니다. 여기 저와 함께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학우 분들도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직 이수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3 가지 교육 중에서도 학교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번 연구모임 주제로 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에 언급되었던 학교교육 개선방안과는 다르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월례토론회에 참여하신 박연수 교수님께서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운동'에 대해 말씀하셨었는데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닌 화장실을 공급하는 250 개의 기관들을 설득하니까 짧은 시간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요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공급자를 설득했기 때문이죠.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공동체의식에 대한 교육이 교사부터 이루어진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동체의식이 보편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혜지 (영문 3): 공동체의식 선진화를 위해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정교육은 국가에서 나서서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시작하는 공동체의식 교육이야말로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정인 (영문 3): 학교생활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과지식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보여주는 태도 또한 그들에게는 모범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주제가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영문 2): 네, 모두들 학교에서 공동체의식교육이 필요함을 느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어야 바로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교사들의 인성교육이 어떻게 행해져야 할지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정인 (영문 3): 저는 먼저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교직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60 시간의 교육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60 시간의 교육봉사 시간을 통해 예비교원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위주의 교육봉사보다는 봉사를 계기로 공동체의식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로서의 소양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정 (영문 2):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60 시간의 교육봉사시간을 통해 예비교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봉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정인 (영문 3): 제가 생각한 교육봉사는 예비교원들이 개인적으로 교육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 단체로 함께 현장에 나가 교육봉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비교원들이 그룹별로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육봉사를 한다면 예비교원들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협동심과 배려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느끼고 이를 실천할 것입니다.

제가 교육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요즘 아이들은 눈치가 무척 빠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의 관계도 빠르게 파악하더군요. 따라서 저는 이러한 교육봉사가 예비교원들뿐만 아니라 해당학생들에게도 올바른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지송 (영문 3): 저 또한 교육봉사 변화를 통해 교사들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교육봉사와 4 학년 때 해야 하는 교생실습 기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봉사와 교생실습 기간은 예비교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사교육 프로그램 실행과제 추진 및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교육실습 기간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교직 인성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실습 기간에 따른 초등 예비교사의 교직인성 차이를 분석했는데 4 주 초과의 교육실습을 받은 초등 예비교사들의 교직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이 아닌 충분한 교육실습과 교육봉사가 이루어진다면 예비교원들의 인성이,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희정 (영문 2): 예비교원들의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직교사 이전에 교단에 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한다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한지송(영문 3): 저는 교원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임용시험에서 논술이나 심층면접을 확대하여 인적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인격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예비교사를 걸러내는 것이죠.

김희정(영문 2): 맞습니다. 임용시험은 예비교원의 지식 정도를 판가름할 뿐 그들의 인성을 평가하지 못하지요. 지금까지 예비교원들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럼 현직 교원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영문 3): 현직 교사의 경우 교사들이 인성을 되돌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연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사가 학생들의 관계를 파악하듯 학생들도 교사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따라서 저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교사들이 서로 모여 교직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연수 기간 중에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 교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상처 입었는지 털어놓으면서 올바른 공동체의식을 정립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희정(영문 2): 연수 이수 시간에 있어 타인에 의해 상처 입었던 경험을 나눔으로써 올바른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연수 과목을 보면 거의 교과 전문 지식에 관한 것인데 이런 시간을 가진다면 좀 더 재미있고 뜻 깊은 연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고 앞으로의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입니다.

이혜지 (영문 3): 저는 학교생활 내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 실천으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각 학년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 매 주, 혹은 매 달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도 다 같이 참여해 성과를 이루어 내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희정(영문 2): 학교 안에서 학년별로 하나의 목표를 세워 이를 달성해나가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할까요?

이혜지(영문 3): 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 교육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요즘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사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없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이를 통해 어떤 성과를 얻었다면 분명 자기소개서의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학업만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 또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김희정 (영문 2): 현재 교육체제 흐름에 따른 참신한 방법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수연 (영문 3): 저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주목했습니다. 공동체의식 부재의 문제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은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돌아보고 극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기르는 공동체의식

김수연(영문 3): 제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힐링캠프나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사들의 심신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언급된 연수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과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좀 더 전문가를 통한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김희정 (영문 2): 네. 전문가와 함께 하는 힐링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의식 함양 방안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가져보았는데요, 적극적인 참여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방안들이 나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교사들의 공동체의식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안과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예비교원들에게는 교육봉사시간과 교생실습의 확대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이 아닌 단체로 이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서 인성을 평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직교사들에 대해서는 연수기간 혹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에서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년

별로 학생과 교사가 모두 참여하여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 또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교사들부터 시작하는 인성교육은 그 대상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하나의 기관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은 단순히 경제적 풍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화된 개인이 모여 선진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이 더욱 확대되어 선진화된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삶,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나라를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L5CpTHJD6Ts
http://vimeo.com/62861847

⑧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이승철(고려체교 4), 김미래(이화과교 4), 강보름(서강국문 4), 이종원(고려역교 4), 이규빈(외대영교 4), 윤원재(성균컴교 4), 남아영(이화교육 4), 박상은(고려영교 4), 김아란(연세수학 4), 강민경(이화과교 4), 이경진(고려가교 4)

남아영(이화교육 4) : 먼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메일로 초청장과 토론문을 보내드렸듯이 지난 3 월 27 일, 공동체의식 선진화 방안에 대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는 선진국이라 부르기에 어색하지 않아 보이지만 정치·사회·문화적 선진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제 83 차 월례토론회에서 여러 분야의 사회 명사들께서는 이처럼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현실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들으며 저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변화를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공동체의식과 같이 정신의 영역을 다룰 때의 접근 방식은 결국 구성원들의 계몽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보아야 할 교육적 방안으로, 첫 째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의 확대를 생각해보았고 둘째로는 교육공동체 형성을 통한 공동체 경험의 증대에 대해서 고민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을 이끌어갈 사범계열 학생들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를 위한 시민교육 확대와 교육공동체 형성에 관해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어떠한 방안을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진(고려가교 4) : 처음 이 주제를 접하고 느꼈던 것은 의식을 바꿈에 있어 '교육'적 접근이라는 것이 무척 효용성이 있고 궁극적인 대안이 되겠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를 위한 방안은 아무래도 막막한 것이 사실이었죠.

우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크게 화제가 된 영화 어벤져스 2 촬영의 예가 대표적이겠는데요. 촬영지를 통제하였으나 난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CCTV 에 접속하여 이를 보고자 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었어요.

강보름(서강국문 4) : 저 역시 그 사례를 듣고 많이 놀랐던 것이 사실이에요. 질서나 배려와 같은 덕목에 위배되는 행위라 볼 수 있겠죠.

이에 처음 해결방안의 주제로 이야기한 시민교육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라는 주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시민교육들은 대개 '사회/도덕' 교과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두 과목의 시수를 늘리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래(이화과교 4) : 저 역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2014 년부터 해당 교과가 일선학교에서 사라지고 2015 년에는 고졸 검정고시에서도 선택과목으로 전락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추세로 가는 것은 영국의 2013 년 Key Stage 3, 4 (7~11 학년) 과정에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2014 년부터 인성 및 시민교육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싱가포르 등 여러 선진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고요. 따라서 세계적 추세이기도 한 교육과정 내 시민교육의 확대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종원(고려역교 4) : 저는 앞선 발언들과는 사뭇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교육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선진화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도덕' 교과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는 학령기의 학생들에게만 적용되어 배제되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이에 저는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교육을 시킨다고 온전히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민들이 공동체의 덕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강민경(이화과교 4) : 저 역시 오로지 시수를 늘리겠다는 접근은 지나치게 단순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주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것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눔과 같은 것은 학습만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린 충분히 많이 '기부'의 가치에 대해 학습하지만 솔직히 제 주변에도 꾸준하게 기부를 하는 사람을 보긴 어려워요. 머리는 알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에는 괴리가 있는 것이죠. 이에 저는 듀이(Dewey)가 이야기했던 'Learning by Doing'을 이러한 공동체의식 교육, 특히 시민교육에 적용하여 일상생활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이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규빈(외대영교 4) :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에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활용하여 궁극적인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은 시민의식이 성숙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문화를 본받는 것이죠.

프랑스는 우리와 달리 입시가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교육과정 전반이 철학과 맞닿아 있고 3 학년 과정인 떼르미날 교육과정에서 시민, 법률, 사회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인 '바칼로레아'에서도 일상과 연계된 철학적인 문제를 내어 이를 깊게 고민하게 하고요.

이처럼 시민교육과 교육평가 간의 간극을 줄여야 올바른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공동체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남아영(이화교육 4) : 여러분들께서 현재 축소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민교육 관련 교과의 현실을 지적하시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요. 다른 토론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물론 시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의식 역시 교육을 통해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는 이와 동시에 교육 전반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방안으로 교육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은(고려영교 4) : 제가 이전에 읽었던 사토 마나부의『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공부'와 '배움'을 구분하는 문구가 나와요. '공부'는 아무런 대화 없이 혼자 지식을 쌓는 것이고 배움은 만나고 대화하고 이해해나가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공동체의식의 부재는 우리가 혼자 '공부'하는 문화에 익숙해져서 함께하는 '배움'에서 멀어진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함께 배우는 문화 형성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입시에 치여 누구와 토론을 하며 학습을 하기 보다는 그저 암기에 급급했던 것 같거든요.

김아란(연세수학 4) : 네, 동의합니다. 공동체의식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경험하며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쟁 문화에 던져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입시라는 거대한 벽으로 인해 자기 공부만 하지 주변을 뒤돌아보는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어린 학생부터 성인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프랑스의 사례를 지적했는데 실제로 프랑스의 도서관은 절대 조용하지 않아요. 함께 배우고 토론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학습방법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공동체에 대한 주장을 하는 이규빈 학우와 이를 경청하는 다른 학우들

이규빈(외대영교 4) : 자연스러운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먼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라는 주제를 받고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정의였습니다. 물론 공동체의식을 '질서, 나눔, 배려'라는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지만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합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며 공동체라는 것을 어디까지로 둘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일리치가 『탈학교사회』에서 지적했듯 우리의 교육은 점차 지역공동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변화하리라 생각해요.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학습동아리'의 활성화가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원재(성균컴교 4) :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공동체의식이 퍼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경험을 증진시켜줘야 하고 이에는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시스템적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스웨덴이나 미국은 특히 학습동아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학습자료 비용 지원 및 리더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역시 이를 본받아 연령과 학벌에 무관한, 말 그대로 의사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철(고려체교 4) : 실제로 제 경험을 빌어 보았을 때 공동체 형성을 통한 학습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대개 중년의 여성들이 취미생활로 하는 활동들이 전부 같습니다. 이에 좀 더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공동체의 일종이며 이를 활용하여 공동체의식 및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 역시 의미가 있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기존의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원하는 학습동아리의 구성원을 모으는 것보다는 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경진(고려가교 4) :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고 구체화하려는 시도는 옳지만 이것과 공동체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동시에 더 자주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공동체의식 캠페인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는 방향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크게 유행했던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처럼 이를 잘 지키는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자연스레 모방 효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남아영(이화교육 4) :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이 고안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실천을 이끄는 데는 적절한 상과 벌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이는 마치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적용되는 문제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할 바는 학습공동체, 즉 배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제대로 체험하고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질서를 자연스레 학습하게 도울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변산공동체가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학습의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산공동체 학교의 경우 어떤 이념이나 종교로 묶이지 않고 말그대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문화가 퍼진다면 선진국민이라면 응당 갖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원재(성균컴교 4) : 지역공동체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동체의식도 일종의 도덕성 함양과 같은 맥락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나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피아제나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상황에 자주 노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인위적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논의했던 학습동아리나 지역공동체의 활용과 함께 공동체의식이 필요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맞닿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아영(이화교육 4) :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교육적 접근을 토대로 한 시민교육 확대와 교육공동체 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하여 시민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적 방안으로는 첫째로, 선진국의 추세에 맞게 전체적인 시수를 증가하는 방안이 이야기되었고 둘째로, 'Learning by doing'이라는 듀이의 모토를 토대로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방법의 개선에 대해 제시해주셨습니다. 셋째로, 시민교육과 교육평가 간의 간극을 줄이는 시도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어 이루어진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로, 학습동아리를 활용하여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덕목 함양, 둘째로, 토론을 바탕으로 한 학습방법의 변화, 셋째로, 지역공동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첫째로, 적절한 보상을 통한 모방 효과를 이용하는 방안과 둘째로, 도덕적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하여 실천력을 상승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공동체의식의 선진화와 그 실천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교육환경과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교육이나 교육공동체 형성을 통한 변화를 꾀하였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토의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미흡하지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연구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⑨ 성균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이명은, 안예은, 이재현, 김수연, 배하연

배하연(교육 3): 성균관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 월 27 일,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하는 '공동체의식(질서,나눔,배려)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의 주제인 '공동체의식(질서,나눔,배려)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월례토론회에 참석하신 6 명의 종교계 인사분들과 전문가분들이 공동체의식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식의 실천의 경우, 개인의 도덕성과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슴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그 점에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디어는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단시간에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대중으로 하여금 공동체의식의 실천을 제안하고 공동체의식을 선진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디어'를 꼽았습니다. 미디어는 대중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대화의 장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미디어의 대중성과 순발력은 이상적 실천모델을 제공하고 대중들이 이를 즉각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교육 매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디어가 공동체의식의 모범사례를 공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공적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을 통한 공동체의식 선진화

김수연(교육 3): 저는 공적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에 찬성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와 케이블 모두에 공적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지상파의 경우 1000 분의 2 에 해당하는 시간을 비상업적 공익 광고에 할당하고 있는데, 그리 큰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프로그램이 시청자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공론화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한 공익광고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81.4%의 응답자가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대답을 내놓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공적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이를 일정도 의무 편성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예은(교육 3): 저는 의무 편성에는 회의적이에요. 방송사 입장에서뿐 아니라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의무적으로 공익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공익 채널로 지정하게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청의 자유까지 침해 당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공익채널로 지정된 후 언론의 탄압을 경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9 년 아르떼 TV 가 공익채널로 지정된 이후에 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해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처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저 역시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미디어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적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의 수익성이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다른 방법을 고안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교육 3): 저도 공적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을 찬성하는 바인데요. 그렇지만, 공적 프로그램의 컨텐츠가 다양화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의식을 강조해왔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서구의 개인주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아노미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노미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공동체의식을 깨우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미디어'가 해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의 공동체의식이 지나치게 '정'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정'에만 호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때문에 지속적인 모범사례의 노출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기부 등의 나눔과 배려의 활동들은 미디어의 노력으로 대중들로 하여금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은(교육 3): 맞아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공동체의식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의무화된 프로그램 편성을 통한 지속적 노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가 가진 스토리텔링의 힘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고, 이는 곧 공동체의식의 고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상업적 광고를 보면서 판매 촉진, 홍보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는데, 이는 상업적 메시지에 대한 대중들의 강박관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죠. 비상업적 광고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상업적 메시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의 질서, 나눔, 배려를 고취하기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배하연(교육 3): 상업 광고 속에서의 비상업적 광고가 대중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재현 학우가 언급한 것처럼 공적 프로그램을 공익광고의 형태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컨텐츠를 다양화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공익 광고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이른 아침이나 아주 늦은 저녁에 방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교육 3): 실제 지상파 TV 에서 방송되는 대부분의 공익광고가 새벽 등 시청률이 가장 낮은 시간대에 집중 편성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 전체 공익광고의 76.2%가 시청률이 가장 저조한 'C 급'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B 급이 8.4%, A 급이 3.7%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공익광고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2 년에 비해서 2013 년에 약 1000 건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방송법이 공적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만 고시하고 있을 뿐, 시급별 방송 시간은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배하연(교육 3): 대부분의 학우들이 공적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이 언론의 침해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에 대응하는 사회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무 편성에 찬성을 해 주었습니다. 단, 의무 편성 이전에 공적 프로그램의 컨텐츠를 다양화하고 방송 시간대도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 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 있다면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해요.

김수연(교육 3): 지난 2007 년까지 4 년 정도에 걸쳐 방송되었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눈을 떠요'라는 코너가 기억에 남습니다. 안구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식 수술을 돕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에도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사람들의 장기 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동안 병원의 문의도 끊이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방송을 통해 공동체의식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대중들에게 공감을 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요.



응급차 양보를 통해 보는 선진 시민의식

안예은(교육 3): 최근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심장이 뛴다'라는 프로그램도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공익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최근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구급차 양보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과 함께 독일의 선진화된 시민의식도 함께 화제가 되었지요.

이 프로그램은 최근 '느낌표'를 이어 공익예능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찬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모세의 기적' 스티커 캠페인도 함께 하며 대중들에게 많은 공감을 사고 있다고 하니 공적 프로그램을 예능 형식으로 푸는 것은 가장 영향력이 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명은(교육 3): 사람들에게 흥미를 살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컨텐츠를 다양화하는 것.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반대로 공동체의식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의 비난 받는 모습을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것도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부정부패의 모습을 고발하는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를 통한 사회적 효과도 막대합니다. 사람들이 반대의 사례를 보고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미디어를 통해 간접 체험해 보는 것도 컨텐츠의 다양화와 더불어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 같아요.

김수연(교육 3): 저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지하철 광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하철 4 호선 광고를 보면 심폐소생술의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그림이 나와있는데, 등·하교시에 늘 주의 깊게 보게 돼요.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지하철 혹은 버스 광고에 '임산부에게 자리 배려해주기' 등의 실제적 실천 방안을 삽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접할수록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실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배하연(교육 3): 실천방안을 삽입한 광고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작은 광고판이나 배너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많이 접할수록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각인되고 내재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항상 접하는 컴퓨터도 빼놓을 수 없는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공익을 실천하는 연예인의 긍정적 파급력

이재현(교육 3): 최근 한 연예인이 프로그램에서 위안부 팔찌를 차고 나왔는데, 이후 위안부 팔찌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폭주하고 품절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교육에 효과적인 대상인 청소년에게 연예인은 좋은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를 이용한 캠페인이나 마케팅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심어 넣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하연(교육 3): 많은 의견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학우들은 기본적으로 공적 프로그램의 컨텐츠가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공익 예능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요,

모범사례를 제시하거나 그 반대의 사례를 제시하여 사람들에게 간접 체험 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의 광고, 인터넷의 배너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광고판을 통해서도 선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스타를 이용한 캠페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의 나비 배지 혹은 위안부 팔찌가 학생들의 눈길을 끌어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들어 공동체의식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를 주관하고 채워나가는 언론인들의 사명감 증진을 위해서는 그들의 공동체의식 교육도 간과할 수 없겠지요. 미디어를 통한 선진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동체의식 교육을 통해 언론인부터 선진화에 앞장 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눔과 배려는 언제나 박수를 받습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의 선진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급격한 성장으로 사회적 가치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편중된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서 한국사회를 돌아보며 가치의 문제에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회 풍요를 위한 공동체의식의 선진화가 미디어를 통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림 3 - 모세의 기적(http://www.youtube.com/watch?v=sCI9P2_P1jI)
그림 4 - 위안부 팔찌(http://www.youtube.com/watch?v=odJ3DPwc0mY)



왼쪽부터 김보경, 박장수, 이승창, 김예지, 이영조, 이귀영

이승창(경영 3) : 벌써 2 번째 성균관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미리 토론 발제문과 초청장을 보내드려서 아시다시피 지난 3 월 27 일,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방안'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이번 토론회에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나눔과 배려 그리고 준법이라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는 문화적 선진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층간소음이라는 문제에도 살인이나 방화라는 범죄행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 혼자만 잘되면 남은 상관 없다는 식의 개인이기주의 사고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예지(미술 3) : 교육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교육의 담당기관인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과 공동체 사이, 공동체 간의 소통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각 주체가 소통의 방법을 모르고 자신의 의견만 피력하다 보니 기분만 상하고 남을 배척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기관에서 입시위주의 수업보다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보경(경영 4) :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시절부터 정규교과목으로 '소통과 이해'와 같은 남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창(경영 3) : 공동체의식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교육에서 '소통과 이해'의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소통과 이해의 과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만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자칫 잘못하면 이 과목 역시 시험이나 성과를 통해 남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과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귀영(통계 4) :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업에 덧붙일 수 있다면 사회적 문제를 역할놀이를 통해 함께 해결하는 수업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님비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쓰레기매립지 지역주민과 담당자 간의 역할을 배분해 보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서로를 소통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의 문제를 역할놀이로 해결하는 교육

이승창(경영 3) : 구성원들이 서로 역할을 배분하여 특정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통과 타협을 통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식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로 일본에서는 질서라는 이름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메이와쿠 가케루나'라는 문화가 교육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첫 수업에서 배우는 사회윤리 교육의 핵심인 이 교육의 효과는 일본 쓰나미 당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며 세계인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한가지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박장수(경영 3) : 저는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간의 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후 3 시만 되면 하교하여 함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클럽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상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어울리는 클럽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승창(경영 3) :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나와 전혀 다른 누군가와 어울리고 만날 수 있는 것은 대학교에 들어와서부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방과후에 클럽활동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경영 4) : 공교육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교육에서 교육의 주체인 부모님을 교육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동체의식 세미나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을 먼저 교육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조(경영 3) : 저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정에서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말없이 TV 만을 보기보다 가족 간에 고마운 점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어가서 이웃 간에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승창(경영 3) : 가정에서 가족 간의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먼저 마련되어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에 이어서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님을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지자체에서의 교육제공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사회적인 교육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지방행정구역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감사운동을 슬로건으로 포항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선진시민의식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행정구역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의식을 슬로건으로 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한다면 그 영향이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승창(경영 3) : 오늘은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토론해 보았습니다. 소통과 이해라는 정규교과목의 개설, 방과후 학생 간의 소통의 환경을 만들 클럽활동,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교육과 가정에서의 소통문화 정착 등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는 곧 문화의 선진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의 선진화를 바탕으로 그 위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선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인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 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에서 부터 오혜린, 이윤경, 신재연, 이덕주, 이찬열, 송경남

송경남(경영 4):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는 지난 3 월 27 일 제 8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각 종교계 인사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목소리를 통해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의식에는 나눔, 배려, 질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에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대한민국은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촌락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도 몇 가정씩 그룹을 맺어 서로서로를 돕게 하던 제도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공동체의식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공동체의 개념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진화 연구모임은 공동체의식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체 의식은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인식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송경남(경영 4): 공동체 의식의 결여는 개인주의와 그리고 개인주의로 팽배한 사회에서의 교육의 부재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공동체의식의 결여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의식의 성립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찬열(법 3): 공동체의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배려와 나눔의 자세로 다가서는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개인화 되어져 간다고 해도 결국 우리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나 자신보다 함께하는 사회가 자신에게 더욱 소중하고 이롭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윤경(아동 3): 공동체의식을 성립시키기 위한 방안은 지역사회나, 구청 같은 나라의 큰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부터 차근히 실현시켜 나가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부터의 시작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추억을 상기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 되면 각 가정에서 김장을 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기간을 잘 사용하여 각 지역 주민들이 같이 김장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회가 아닌, 지역사회에서부터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면에 내재된 공동체 의식을 끄집어 냄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덕주(행정 3): 저는 공동체 의식을 성립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시험과목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초, 중, 고 시절에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침 8 시부터 오후 3 시 이후까지 국영수에만 학생들을 가둬두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체육을 통해 더불어하는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윤리, 도덕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사람들과 같이 사는 법을 알고, 생각하는 법을 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정착되게 해야 할 것 입니다.

필요하다면 공동체에 대한 논술형 시험까지 도입하여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동체의식이 자신들에게는 쓸데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놔두어서는 안 될 것임을 교육을 통해 정확히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 입니다.

오혜린(아동 3): 저 또한 교육의 중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서로 바빠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주말저녁밖에 없고 요즘은 명절에 해외로 여행가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친척들끼리도 만나는 일이 많이 없어졌는데 서로의 가족을 좀 더 챙기고 소중히 여기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쏟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 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족에서부터의 공동체 의식의 성립은 성장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회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하게 되며 이것은 다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파되어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재연(경영 3): 공동체 의식은 단기간에 향상되거나 성립되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동체 의식은 올바른 시민의식에 대한 학교 교육에 의해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공동체의 존재와 의미를 알아가면서 바람직한 '개인'의 역할을 배워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장려하는 국가 차원의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국민들이 삶에 스며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양보 캠페인이나 환경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메시지에 노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홍상범(경영 3): 신재연 학우가 말해주었듯이 공동체의식은 단기간에 형성되거나 성립되기 힘드므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체의식을 점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익 광고나 도서, 뉴스, 신문 등의 언론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공동체의식에 대한 시각을 자주 노출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의식 상태에서 접한 정보는 자신도 모른채 각인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에 대한 시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과거의 공동체의식의 좋은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송경남(경영 4): 지금까지 공동체 의식은 무엇인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 공동체 의식의 성립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사회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모두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가까운 곳에서 공동체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회에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의식을 성립할 수 있는 방안에는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에서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먼저 성립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눔, 배려, 질서는 우리가 공동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부재는 전체를 한꺼번에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성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여러분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실천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의 시작일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시작하는 공동체의식이 곧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진화 연구모임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주시고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⑪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유하정, 주연아, 장애리, 전용택, 고성헌, 오민석 학우

주연아(경영 3) :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선진화포럼에서 '83 차 월례토론회' 의 주제였던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진행되었던 논의의 일부분이었던 공동체 정신 확립을 위한 방안 논의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서준수의 중요성', 그리고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한 공동체 정신의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주변에서 공동체 정신의 부재를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꼈던 적은 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오민석(생명과학 4): 아무래도 대학생으로서 다른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학교 수업시간입니다.

주연아 학우가 오늘 모임에 앞서 공유한 칼럼에서도 이야기 되어있듯이, 수업시간에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핸드폰 진동, 또는 알림음이 울리는 것이 예민한 학생들에게는 집중하는 데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나아가 저는 지하철로 아침에 등교를 할 때마다 '내릴 사람이 내린 뒤 승차하기'의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꼈던 때가 참 많습니다.

고성헌(자연환경 공학 3): 저의 경우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질서가 좀 더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이 모두 한 번 쯤은 있을텐데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화장실을 앞서 이용했던 사람이 '뒷처리' 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난 경우입니다.

화장실에 들어섰는데 변기 뚜껑이 닫혀있는 경우, '두려움'을 느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물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이걸 지키지 않아서 뒷 사람은 한마디로 '낭패' 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상식적으로 '질서'라고 생각되는 원칙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키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의 의미는?

주연아(경영 3) :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에 '공동체 정신'의 실천이 필요함을 항상 명시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체 정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동체 정신’은 ‘집단주의’와는 확연히 구분히 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집단이기주의’와도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집단주의는, 자신이 속한 그룹의 이익만을 중요시하고,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는 상황을 빚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정신’ 이란, 다양한 생각과 모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다툼없이 조화롭게 지낼 수 있기 위한 마음가짐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의논하고자 하는 질서의 중요성 또한 공동체 정신을 이루는 요소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오민석(생명과학 4): 저는 주연아 학우가 지적한 부분과 동일한 맥락에서 공동체 정신은 '질서 준수의 중요성 및 실천에 대한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례토론회의 발제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질서 준수가 배려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나눔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것일테니까요.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된 질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단주의'가 강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를 따라하는 '동조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지요.

이게 긍정적으로 발현된다면 집단 중 한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좋은 일을 따라하게 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확산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될 거예요.

예를 들면, 등산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쓰고 난 종이컵을 어딘가에 버리고 간 뒤에, 같은 자리에 수많은 종이컵이 잇따라 쌓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주연아(경영 3): 지금까지 공동체 정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서준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어떻게 이런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도덕시간에 '준법정신'에 대해 배우면서 우수 해외사례로 일본과 싱가포르의 예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요.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릴 경우, 지폐의 '90%' 이상이 회수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가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도덕적 수준을 뒷받침 해주는 것은 엄격한 통제와 법률 때문인데요,

거리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껌을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마약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할 경우 징역뿐 아니라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또한 거리에 침만 뱉어도 500~2000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하기도 하구요.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아직까지 '채찍'을 맞는 형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처벌시 맞게되는 채찍의 강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대만 맞아도 기절할 정도이고, 그 상처가 낫기까지 2~3 달은 족히 걸린다고 해요.

흥미로운 것은 싱가포르 국민들은 이런 채찍형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처벌이 있어야 사회 기강이 바로 잡힌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이겠지요.



질서정연하며 깔끔한 싱가포르 도로의 모습

고성헌(자연환경 공학 3): 주연아 학우가 지적한 것처럼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분명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질서'의 권위를 세워주는 '강도 높은 처벌'이 질서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질서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으로부터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열리기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일본의 삿포로 축제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과 독일의 옥토버페스트와 함께 세계 3 대 축제에 포함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이때 매우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동경 시내는 매우 혼잡해지는데요, 그럼에도 시민들이 모두 지시에 맞춰 자신의 입장차례를 기다리는가 하면, 미리 마련되어 있는 분리 수거함에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질서를 잘 준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성급함 때문에 빨리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으면 금세 볼멘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하정(생명과학 1): 저는 어렸을 때 6 개월 정도 독일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때 독일인들을 보면서 한국과 다르다고 느꼈던 점이, 독일인들은 문을 열고 어딘가에 들어갈 때 자기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뒷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닫히지 않게 계속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호의를 받은 사람을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또 잡아주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 돌아오니 이런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들더라구요.

오민석(생명과학 4): 저는 얼마 전에 학교에서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고 있었는데 결국 저를 이어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10 명 이상이 입장할 때까지 계속 문을 잡고만 있었던 생각이 나네요. 왠지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주연아(경영 3): 네. 질서준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에 대한 예로서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보았네요. 다음으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어떻게 공동체 정신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스토리텔링' 방법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느꼈던 적은 언제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화, 책, 광고 등 어떤 매체를 통해 접했던지 자유롭게 발언 부탁드립니다.

전용택(융합전자공학 3): 저는 tv N 에서 방영 중인 '젠틀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스토리텔링이란 이런것이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젠틀맨 프로그램의 취지는 배려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시민'을 발견해내고 이런 시민의 바람직한 예를 방송을 통해 보여주면서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방송을 통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연출하고, 이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나서는 시민의 행동을 취재하는 것이지요. 비록 연출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방송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배려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민석(생명과학 4): 요즘은 SNS 의 시대잖아요? 뭔가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거나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있으면 페이스북, 또는 유투브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거죠.

그런 점에서 좋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UCC 가 제작된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확산시킬 여지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주연아(경영 3): 저는 얼마전 '국제경영' 시간에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HSBC 은행의 사례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HSBC 은행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많은 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진출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본 광고의 배경은, 미국의 지하철 안에서 한 동양인 남자가 우락부락하게 생긴 백인남자에게 어깨를 기대고 졸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졸면서 다른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미국에서는 다소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텐데, 광고 속의 백인남자는 졸고있는 동양남자를 밀쳐내거나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도 조는 척을 하면서 옆에 있는 여자의 어깨에 기대지요. 이 백인남자의 의도가 조는 것을 핑계로 여자의 어깨에 기대보려는 것인지 어떤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동양인들 존중해 주는 배려가 깔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훈훈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문장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학생의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방법을 통해 공동체 정신의 메시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하정(생명과학 1):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양대학교 내에서 '질서를 잘 지킵시다'를 메시지로 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대회를 개최하여서 우수 동영상을 만든 학생에게는 상을 주여하는 방식으로 공모전을 한다면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좁게는 한양대학교 내 방송국을 통해 학우들에게 보여주고, 넓게는 유투브,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한다면 덩달아 한양대학교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사회의 도덕수준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전용택(융합전자공학 3): 저는 다른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재학시절 일주일에 한번씩 '마니또'을 정했던 적이 있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번주에 내가 신경써서 도와줘야 할 친구를 정한 다음, 일주일 동안 몰래 친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거죠.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내가 마니또였다는 것을 공개하구요.

대학교 내에서도 동아리 내에서, 또는 학과 안에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해 보면 친구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배려의 마음을 체험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애리(정책 3): 저는 우리가 하는 '한양대 선진화 연구모임'처럼 함께 자신의 체험을 나눠보는 토론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마다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체 정신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더욱 많은 스토리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연아(경영 3):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은 통해 스토리텔링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을 비롯하여, '마니또' 이벤트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것과 '토론모임'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토론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한국의 공동체 정신 부재의 현주소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질서가 잘 준수되고 있는 선진국의 예, 스토리텔링 방식의 효과, 마지막으로 대학생으로서 공동체 정신 확산을 위한 방안제시의 순서로 연구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체 정신'이란 집단이기주의와는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며, 질서준수가 공동체 정신의 일부분임을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질서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일본과 싱가포르의 우수 준법정신으로 나타나는 질서실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송, 광고 등에서 나타난 인상적인 스토리텔링 방법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함에 대해 이야기 하였는데요.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의 의미를 영상, 글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마니또' 같은 방법으로 '배려'의 정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집단토론을 통해 개인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2 차 한양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⑫ 배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김범근, 박하연, 한지훈, 한윤성, 유병덕, 최다은, 이세현 (사진: 김예진)

김예진(바이오·의생명 2) : 지금부터 배재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구모임은 지난 3 월 27 일에 열린 제 83 차 월례토론회 '공동체의식(나눔, 배려 등)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서 제시된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 나가야 할 '공동체의식의 선진화'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다양한 공동체의식 중에서도 질서와 나눔, 배려를 강조하시며 교육의 힘에 의하여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셨고, 임성빈 장신대 교수는 종교공동체들이 말하는 가치를 들어주시며 종교적 관점에서 사회 선진화를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금강 미황사 주지스님은 개인의 삶이 곧 공동체의 삶이라는 의식의 구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최준규 가톨릭대 신부는 사회의 상생과 정직을 중요시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원 서울예대 교수는 공동체 사회를 위한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박연수 고려대 초빙교수는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라는 생각의 확산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중 양삼승 변호사께서 강조하신 '질서의식'의 구현을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지라고 생각하여 질서의식이 결여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선 우리나라 질서의식의 현재 모습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대두된 '버스 민폐' 사례

김범근(정치언론 3) : 최근 SNS 에 올라와 화제가 된 한 사진이 있습니다. 버스 좌석을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미리 버스를 탄 사람들이 모두 좌석의 바깥 쪽에만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리 앉은 사람이 좌석 바깥쪽에 앉으면 이후에 사람들이 앉을 때마다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리를 비켜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내리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은 자신의 이기심으로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현대인을 단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세현(원예조경 2) : 저도 김범근 학우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예시를 제시해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학우 분들께서 아마 한번 쯤 각종 비리에 관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법 위반, 금전적 비리, 일명 '뒷돈 빼돌리기' 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TV, 인터넷 등의 미디어 매체들에서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나라의 낮아진 질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하연(간호 2) : 서구화된 문물이 급격히 도입되면서 사람들의 생각 역시 서구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동양의 집단주의에만 치우쳐진 과거보다 서양의 개인주의가 많이 심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똑같이 보고 이를 혼동하여 자신의 이기심을 개인주의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라는 말을 하곤 하죠. 이러한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질서의식 수준을 만든 발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예진(바이오·의생명 2) :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일상생활의 모습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질서의식이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즉 질서의식의 선진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근(정치언론 3) :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질서의식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를 김예진 학우가 칼럼에서 '점잖음이 무능으로 보여지는 사회'라고 언급하신 것처럼 법을 지정해도 '법을 지켰을 때 얻는 것이 없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이미 자리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치주의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병덕(경영 4) :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여 법에 관련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주지 않는데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처럼 '법'도 하나의 질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윤성(정치언론 2) : 저 역시 김범근 학우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법보다 '인식의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학교나 영화관 등 외부에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를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줄 서기 운동이라고 큰 강요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두서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한 줄로 질서를 지키면 시간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질서를 지키면 오히려 나에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사람들에게 질서가 강요받는 행동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질서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지훈(영어영문 3) :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셨던 의견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의 확산의 해결 방안으로 적용되는 것은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편함을 겪게 되는 사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무단 횡단처럼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바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질서를 지키지 않았더니 빠르게 길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례에서는 다소 적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윤성(정치언론 2) : 한지훈 학우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례에 걸쳐 완전한 해소를 만들어내는 방안이라고 말하기엔 어렵죠. 하지만 이는 '잠시의 편안함을 위해 큰 사건, 사고를 겪을 위험을 만드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의 확산이 함께 수반된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높은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의 소재로도 사용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최다운(미디어 1) :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빨리빨리 문화'의 약화가 질서의식 구현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모두 한 번쯤 TV 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광고로 사용될 만큼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이 결과지상주의를 초래하였고, 초래된 결과지상주의는 삼풍백화점 부실 공사, 성수대교 붕괴 등의 기초 질서가 부족했던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따라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그래서 '천천히'가 늘어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 또한 기초 질서의 선진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지훈(영어영문 3) :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자면, 일본은 튀거나 남들보다 나를 강조하는 일보다는 남을 돕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일본은 가정, 학교 등에서 엄격한 질서교육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 기초 질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질서 준수와 연관된 참신한 프로그램과 광고로 교육을 통한 질서 의식의 선진화를 구현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예진(바이오·의생명 2) : 다양하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것처럼 공동체의식, 특히 기초 질서의 선진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그리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무질서한 모습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 배재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국민들에게 '나를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 심어주기, 결과만을 위한 '빨리빨리 문화'의 감소, 기초 질서 의식과 관련된 교육의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들로 기초 질서가 하루 빨리 완전한 구축을 이루어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날개를 달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림 2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xKfUxmkF1Vw
그림 3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QxfwDGrsZtI

⑬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우한준, 김유라, 구미연, 최우석, 천준희

김유라(심리학과 4):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3 차 월례토론회에서 열린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기반으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개인이 행동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눔, 배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룩해야 하는지 지적 교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나 회사의 실적, 나의 외모 가꾸기 등 잘된 경우를 보고 자신도 그것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무조건 다른 사람을 깔아 뭉게고 나만이 돋보이려는 이기적인 경쟁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공동체의식의 결여로 인한 문제점을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층간 소음이라는 '배려없는' 행동

구미연(정보통계학과 4) :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저는 13 년 째 살고 있는데, 처음으로 최근에 이웃집 간의 아주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층간소음이었는데요. 밤 늦게까지 아이의 방방 뛰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러다 멈추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소음 때문에 저는 그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런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때, 부모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제재도 없이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공동체를 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라(심리학과 4) : 저도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건강악화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하면 심하다고 건강까지 해할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화장실에서 트는 물소리와 아이들이 뛰는 소리의 dB 을 비교했는데,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무려 3 배가 더 높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건강상의 악화도 굉장히 심해진다는 그래프를 보았습니다.

가끔 일어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살해 현상이 그럴 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 말씀해주십시오.

최우석(경영학과 4) :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서로서로 돕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서, 나눔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 의식을 예전 만큼 발휘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한국사회 내의 문제와 전 세계의 문제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조선 시대나 옛 시대에서는 선조들은 정이 넘쳤고 경쟁보다는 서로 베푸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1950 년대 이후,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급속한 산업 성장에 비해 시민의식은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한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들만의 서로의 경쟁심이 더 커졌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공동체 정신보다는 개인 이기적인 성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 이기주의가 강해진 이유로는 빈부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위기이다 보니깐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려 하고 사람들은 줄어든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보다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주변을 둘러보면 벤치에 앉아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애정행각이나 마녀사냥 등이 있습니다.

우한준(경영학과 4) :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으로는 사람들이 틀에 박힌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목적의식도 없이 그저 정의나 본인들의 연고 주의 때문에 얽매여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우리는 봉사시간을 채워야만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의미의 중요성을 느끼기 보다는 강제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봉사를 더 꺼리게 하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따라서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인 주변 환경에 의해 생겨나는 문화적인 공동체 의식은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에만 발휘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인지 의구심이 들게 만듭니다. 다수의 무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현상인데, 이런 것이 당연하게 본인의 역할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에게 역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 담당에 있어서의 기능적인 문제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자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준희(생물의소재공학과 5) :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 하지만, 'better life index'가 OECD 국가들 중 개인 삶의 행복지수를 평가한 것에서 한국은 36 개국 중에서 27 위를 했습니다.

시민 참여나 교육 지표에서는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지만, 삶의 만족도나 건강, 일과 생활의 균형 지표에서는 최하위권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77%만이 있다고 응답해 OECD 평균인 90%에 못 미치는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국가 순위로는 전체 36 개국 중에 34 등,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서 3 번 째이고요. 연고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촘촘하게 맺어진 연고 그물망에서 한국인들은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는데, 거기서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절망감에 삶의 의욕이 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갖춰야할 필수 의식인 공동체의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요즘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그들만의 세상이다'라고 생각 한다면 지속가능 한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빠른 산업화로 인해 선진 시민의식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함께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현재 사회는 너무 각박해졌기 때문에 이기주의 사회가 팽배해졌습니다.



김유라(심리학과 4) : 여러분의 많은 문제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할 수 있는 원천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아이들의 지적 성장이 발달되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 중에 공동체 의식을 가르칠 수 있는 나눔과 배려를 강조하는 것, 또는 그것을 모두 포괄한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미연(정보통계학과 4) :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 또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른들이 변해야 아이들이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모방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을 닮고 싶어 하는 동일시 심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 하기 때문에 부모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비심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은 일상생활을 통해 내재화되지 않으면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식탁 차리기, 화분에 물주기, 현관 청소하기 등을 통해 가족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봉사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민 간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상호 신뢰와 협동,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을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연예인 대표 부부인 지누션의 션과 정혜영 부부는 그들의 아이들 이름으로 매년 생일 때마다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 돈을 모아 1 년에 한 번씩 인공 귀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합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부문화를 접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교육이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 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원준희(생물의소재공학과 5) : 공동체 의식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나 자신부터 인정을 하고 나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에 익숙하게 다가서야 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최근의 시대적인 정신과 흐름에 다가온 문명의 진화와 그 변화하는 패러다임으로 볼 때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공동체 의식으로부터 풍토 쇄신은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는 역시 기업가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사회 활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CSR 이 국내 외에 추구되는 중요성으로 볼 때 느낄 수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문명의 진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는 것과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인간존중 의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잘 살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것에 벗어나 우리 모두 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의 기본은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고등 교육에서 교과목의 개설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사회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런 분위기를 미국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스펙 쌓기' 보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성숙시켜 나갈 때, 우리 모두의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가 점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한준(경영학과 4) : 저는 사회교육적인 방법으로 얘기하자면, 봉사단체에서 행하는 봉사활동을 직접적으로 깨달음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학교에서 이런 공동체의식을 가르칠 때, 개념만이 아니라 체험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공동체의식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저금통을 통해서 또는 유니세프에서 행하는 'save the children'과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world vision'등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석(경영학과 4) :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공동체의식의 결여로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았는데요. 앞에 학우들이 말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상황을 벤치마킹하거나 부모의 의식을 바꾸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어른들의 의식을 바꾼다는 점에서 사람의 생각이 하루 이틀도 아닌 몇십 년에 걸쳐 굳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이나 독일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와 같지 않습니다. 예로, 미국은 단독주택으로 띄엄띄엄 지어져 있기 때문에 밤에 아이가 울어도 그 아이의 독립성을 위해서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것은 주위에 피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리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모방보다 한국식 모델로 바꾸어서 행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선진국의 문턱에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보다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시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공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집중할 수 없을뿐더러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바람은 이루어 질 수 없죠.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나 그런 것들을 이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경쟁을 모토로 잡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연(정보통계학과 4) : 그렇다면 적절한 때는 언제인가요? 그렇게 해야할 때가 꼭 있어야만 하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공동체의 결여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기보다는 교육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석(경영학과 4) : 외국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때 100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민의식도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봤자 바로 눈앞에서 보일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은 방법은 교육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이지만, 앞으로도 최소 40~50 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라(심리학과 4) : 지금까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토의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이룩한 것은 어디서도 내놓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압축 성장을 이룩한 것처럼 지금 한국에게 부족한 것들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에 따른 부작용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살면 좋은 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함께 보고 자랄 수 있는 가족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가볍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생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노력한다면 40 년이 아닌 더 빠른 시간 내에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현재 세태에서 교육의 원천을 배출하는 학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려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실천하게 한다면, 그 기억이 잘 잊혀지지 않을까요?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배려'입니다. 말로 정의하는 배려로 모두가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우리의 옛 속담도 있듯이, 내가 한 행동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단 3 초만 투자한다면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공동체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출처 1) : http://www.youtube.com/watch?v=jyPPydyvCkE

⑭ 군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문성현, 김현경, 전성문, 정자연, 김준수, 김다정, 노미영(사진)

김현경(해양 4) : 지금부터 군산대학교 2 차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차 연구모임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3 월 27 일 83 차 월례토론회 “공동체의식(나눔, 배려 등)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일체화가 되면서 공동체라는 의미가 무색하리 만큼 많은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인간은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화목, 이웃들과 형성한 사회에서의 믿음을 통해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타인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가진다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이야 말로 사람의 향기이고, 선진시민 국가의 품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83 차 월례회에서는 많은 전문 관계자 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나눔’, ‘배려’, ‘질서’, ‘주도적’이라는 키워드로 공동체 의식을 위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공동체의식의 실천을 위해서는 개인의 내실이 정립되어 모범적으로 먼저 선행하여 후손들이 자연스레 공동체의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대 학생이, 더 나아가 대학생이 지녀야 할 공동체 의식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자연(사학 4) : 저는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는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럽여행을 다녀오면서 유럽인들의 선진 의식에서 그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유럽 선진시민들은 자신이 들어간 문을 바로 닫지 않고, 조금 기다려 줍니다. 뒷사람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배려해 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짐이 많은 사람이 뒤에 있다면 문을 잡아주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가기 때문에 고급 백화점에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경(해양 4) : 문을 열어주는 간단한 행위에서도 뒷사람을 생각하는 배려가 보인다는 인상적인 선진국가의 실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려에 관한 덧붙일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문(사학 4) : 배려는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마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배려의 마음을 가진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도덕윤리 교육을 받으면서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잠정적으로 내가 건강하여서 자리를 양보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곧,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배려라는 마음이 자연스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으로 치닫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바쁘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 다른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다보니 자신의 것으로 도움을 주려는 생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회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열매로 기부금을 조금씩 모아서 전달하는 후원이 이를 실천하고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노미영(영어영문 4) : 전성문 학우가 말한 도움을 주기보다 받는 데 익숙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배려의 마음을 갖는 여유가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여서 남을 도와준다는 우월적인 의미를 초월하여서 서로 주고 받는 커뮤니케이션인 나눔 의식이 공동체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듯이 주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는 상호 간의 교류가 있어야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냥 주는 것만 있다면, 줄 것이 없어지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자신의 것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저는 선진의식의 기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주고 받는 나눔을 학교에서부터 대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이 사용하였던 교재와 의류, 물건, 심지어는 지적인 내용까지 학교에서 나눔 장터를 개최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각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짐일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됨으로써 자연스레 나눔 의식이 심겨질 것입니다.



나눔 속에 싹트는 배려의 공동체 의식

문성현(영어영문 4) : 저도 노미영 학우의 말에 동의합니다. 작년에 해외봉사를 갔을 때, 저희는 캄보디아 시장에서 플리마켓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필요하지 않은 옷과 물품들을 지원받으면서 기부자들에게는 자신의 것을 정리하는 시간도 만들어 주면서, 필요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면서, 판매 수익금으로 현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을 주었을 뿐인데, 나에게는 필요한 나눔 의식의 뿌듯함을 주었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필요를 충족시켰으며,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환경변화와 재정적인 지원을 더욱 할 수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모두 참여하면서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됨과 한국과 캄보디아의 국가적 수준을 넘어 선진국에 살고 있는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김현경(해양 4) : 네, 전성문 학우의 배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핵심을 담고 있으면서, 노미영 학우와 문성현 학우는 주고받는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 나눔에 대해 플리마켓과 나눔 장터를 통하여서 실천을 해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교정에 방치된 황룡마루,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김준수(사학 4) : 저는 노미영 학우가 발언한 나눔 장터에 대해 적절한 나눔의 장소를 모색하다가 학교에 며칠 전까지 방치되어 있던 황룡마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매점으로 사용되었던 도서관 앞 황룡마루는 학생들의 쉼터이자, 지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점이 도서관 내로 들어가게 되면서 학교의 상징물인 삼각형의 루브르 황룡마루의 활용도는 떨어지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존재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작년에는 '방치된 황룡마루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미영 학우가 말했던 나눔 장터로 이용하자는 의견과 학생들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사용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1 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달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학생들의 역사의식 함양과 역사교육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사학과의 입장으로 좋은 일이지만, 조금 더 선행되었거나 그 전에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나눔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눔 장터를 개설한다든지, 인근 초등학생들에게 지적 나눔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멘토링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었다면,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안정화된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 나눔의 상징으로 군산대학교의 루브르 양성소가 랜드마크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다정(사학 4) : 도서관을 갈 때마다 텅 비어있는 황룡마루는 어떻게 사용될까 늘 궁금했었는데, 학생들을 위한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정말 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인데, 조금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결국은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선진 의식이 제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방치된 공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학교가 변했던 것처럼, 공동체의식을 위한 나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선진화 연구모임과 같은 동아리가 많이 생겨나서 학생들이 생활 내에 선진 의식을 자연스레 함양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의견을 투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참여 발표회를 개최하고, 공동체 생활의 선진 의식을 심어주는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공동체

김현경(해양 4) : 모든 토론자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오늘 연구모임을 정리하자면, 배려와 나눔은 자연스럽게 생활 속, 사회 속 분위기가 형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배려와 상호 간의 교류가 지속되는 나눔을 위해서는 나 혼자 스스로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공동체는 건강히 발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구모임에서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였을 때, 사랑의 빵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은다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나눔 실천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선진국가의 예를 직접 들어주면서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친절한 나눔은 생활 습관과 나라 정서 속에 자연스레 녹아있던 문화와 같은 것으로 우리나라도 내가 들어가고 난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작은 실천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선진문화의 시작을 해야 겠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화 연구모임과 같은 동아리가 많이 창설되고 활동하여서 선진국가를 이끌 주력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적인 형태가 많이 취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산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이 주축이 되어서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선진 의식의 필요성과 연구에 대해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도 나누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의견을 교류하고 서로를 위한 나눔 방안을 생각하다 보면, 방치되었던 황룡마루가 학생들의 역사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와 사회를 위한 공동체 선진 의식을 가지고 학생회를 통해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동체의식 속 나눔의 실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이 누군가는 필요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좋은 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⑮ 공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현기, 심성보, 안은별 양인모

심성보(공주대 화공 2) : 이제 2 차 공주대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메일로 초청장과 토론문을 보내드렸듯이 지난 3 월 27 일 '공동체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 칼럼의 주제였던 것처럼 공동체 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사회를 바꾸는 힘은 바로 저희 대학생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많은 시민운동이 대학생들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 또한 대학생들이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현재 토론을 하고 있는 저희도 대학생으로서 나눔, 질서, 배려라는 공동체 의식의 세 가지 덕목을 익히 알고 있고 공동체 의식을 위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는 '상대방을 위해 배려를 해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박혀있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오늘날의 대학생이 공동체 의식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인모(공주대 화공 3) : 저는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대외활동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많은 대외 활동이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에는 단순히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 봉사 활동, 멘토링 혹은 기업 탐방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외 활동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업에서 대외 활동을 운영할 때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시키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기업에서도 채용을 할 때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지원자를 더 선호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운영하는 대외활동에 공동체 의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는 것이 미래를 보았을 때 결코 불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은별(공주대 화공 4) : 기업의 대외 활동에 공동체 의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외 활동을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스펙을 위한 대외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대외 활동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합니다.

심성보(공주대 화공 2) : 그렇다면 기업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인모(공주대 화공 3) : 저는 기업에서 공동체 의식을 위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피켓을 준비하고 야외에서 직접 사람들 앞에서 하는 캠페인 활동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할 때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장소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인 '지옥철'을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는 지하철역으로 직접 가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껴서 마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김현기(공주대 화공 4) : 공동체 의식의 부족으로 발생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장에 가서 캠페인을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캠페인 활동에 UCC, 블로그 등의 인터넷 홍보를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소셜네트워크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성보(공주대 화공 2) : 대외활동 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한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해외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조사하신 분 있나요?

김현기(공주대 화공 4) : 저는 프랑스의 '솔리다리테'를 조사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소외문제를 부자가 빈자를 돕는 자선이나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와 연대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단적인 예로 12~3 월 사이에는 파리 지하철역의 문을 내리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나 거지들이 따뜻한 지하철 역내에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호센터의 특수 차량들은 매일 밤거리를 돌며 거지들을 데려가 따뜻한 음식과 공동숙소를 제공합니다.

거지는 물론 빠듯한 살림에 여유 있게 슈퍼도 맘껏 이용해보지 못하는 저소득계층들도 똑같이 사회적 부를 공유하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프랑스는 전국에 정식 등록단체만 약 70 만 개나 되는 사회운동의 나라입니다.

안은별(공주대 화공 4) : 저도 프랑스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프랑스에는 3 백만 명의 실업자가 있지만 정작 배고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이들의 연대의식은 '누구나 소외계층이 될 수 있다' '모두가 함께 살자'는 생각에 바탕으로 수십 만의 프랑스인들이 자원 봉사자와 후원자로 참여하여서 돕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공동체 의식은 공부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인모(공주대 화공 3) :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 방법으로 저는 포항시의 감사운동을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안은별 학우가 언급했듯이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감사운동을 확산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한 운동도 정부 기관의 주도 아래 이뤄진다면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성보(공주대 화공 2) : 오늘은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을 키울 방안으로는 대외활동 프로그램에 공동체 의식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추가하는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캠페인 활동의 내용으로는 공동체 의식의 부족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장소에 가서 피켓을 들고 공동체 의식을 알리는 활동과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UCC 제작 및 블로그 활동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외 활동이 대외 활동의 진정성을 잃고 스펙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되어서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본 해외 사례에서는 프랑스의 '솔리다리테'가 나왔습니다.

‘솔리다리테’는 프랑스인들은 소외문제를 부자가 빈자를 돕는 자선이나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와 연대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지하철 문을 닫지 않는 것과 프랑스에는 실업자가 있어도 배고픈 사람이 없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자료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것과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⑯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전미래, 황단비, 장윤석, 최무성, 한범희

장윤석(신문방송 4) : 지금부터 원광대학교 2 차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차 연구모임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공동체의식(나눔, 배려 등)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2014 년 3 월 월례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격려보다는 서로를 짓밟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개인을 생각하고, 칭찬보다는 상호비방의 경쟁의 시대로 이웃 간, 사회적으로 신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OECD 국가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갈등지수는 2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최소 82 조 원에서 최대 246 조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83 차 월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패널분 중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님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고, 임성빈 장신대 교수(기독교문화)님은 기독교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며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금강스님(미황사 주지, 조계종 교육아사리)은 올바름으로 향하는 사람의 중요성, 종교단체들의 올바름을 향한 역할, 치유프로그램보다는 치유 이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박상원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님(방송인)은 사회의 선배들의 솔선수범을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과, 자원봉사등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변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연수 고려대 교수님(특별위원회 위원)은 요람에서부터의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패널분들의 의견 중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의식 실천방안을 제시하면서 칼럼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사회 교육 중 미디어에 의한 교육을 중심으로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연구모임도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의식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칼럼을 작성하면서 미디어에 노출되는 공인들의 공동체의식을 위한 행동, 공중파를 통한 공동체의식 프로그램 제작, sns 를 통한 공동체의식 확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패널분들이 접해본 공동체 의식에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sns 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단비(행정 3) : 페이스북을 이용하다가 독일의 "모세의 기적"이라는 영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이지만 응급차가 지나가니까 막혔던 고속도로가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듯 응급차가 달릴 수 있도록 비켜주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저는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무성(신문방송 4) : 저는 황단비 학우가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하는 생각에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고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3 월쯤 저는 "심장이 뛴다"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하지절단 환자를 태우고 병원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꽉 막혀있었고, 싸이렌을 울려도 방송을 해도 비키기는 커녕 응급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박기웅이라는 배우도 답답함을 표출했고, 시청하는 저 또한 우리나라의 공동체 시민의식 수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장윤석(신문방송 4) : 미디어를 통해 독일의 "모세의 기적"과 한국의 "모세의 기적"을 비교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학우의 경험을 들어보니 한국의 공동체 의식은 아직 부족함이 많이 보입니다.

전미래(신문방송 4) : 저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위캔두댓"이라는 영화입니다. 밀라노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영화에서 나온 주인공은 정신지체 장애인이지만 일을 하면서 그들만의 그룹홈 생활을 하며 사회의 일원이 되는 그림을 그린 영화입니다. 실제로 1980 년대부터 이탈리아는 정신병원을 없애기 시작했고 1999 년 모든 정신병원이 폐지가 됩니다. "자유가 치료다"라는 생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병원에 감금되어 있던 환자들을 일반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역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사회의 하나의 공동체로서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영화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많은데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범희(신문방송 4) : 전미래 학우가 말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전 sns 를 통해서 예전 "무릎팍 도사"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된 손님은 "양심 냉장고"를 제작한 PD 였습니다. PD 는 새벽에 영상을 찍다가 정지선을 지키는 시민을 발견합니다. 정지선을 지킨 시민을 찾아갔는데 주인공은 바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애인은 "신호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를 보고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보다 멀쩡한 우리가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도 하나의 공동체로써 배울점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윤석(신문방송 4) : 두 학우는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하여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각자 공동체의식이 드러나는 미디어를 통해 보고 느꼈던 소감을 말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미디어가 많이 생겨난다면 사람들에게 공동체의식 함양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거 같습니다. 이러한 미디어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항상 좋은 쪽으로만 흘러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는 미디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범희(신문방송 4) : 우리나라 미디어의 문제점이라면 특정 소재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말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항상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드라마를 보면 의학드라마나, 학교드라마 등은 그 주제만을 갖고 영상이 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드라마나 예능을 보더라도 “사랑”이 들어 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무성(신문방송 4) : 맞아요, 우리나라의 현재 미디어는 황색저널리즘에 빠져 있어요. 황색저널리즘 하면 자극적인 소재로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위한 참신한 프로그램보다는 액션, 멜로 등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죠.

전미래(신문방송 4) : 저도 같은 생각이고 공감되는 말이에요.

최무성(신문방송 4) : TV 방송 말고도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잡지를 보더라도 패션, 운동 잡지는 서점을 가더라도 앞에 진열되어 있어요. 좋은 생각처럼 공동체의식을 다룬 잡지는 뒤편에 있고, 신문의 경우에는 스포츠나 정치 등 자극적인 소재만 앞에 싣고 있죠.

장윤석(신문방송 4) : 지금까지 공동체 의식을 위한 미디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에 관한 토론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황색저널리즘에 젖어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공동체의식 프로그램이 나올 수 없다는 것과 잡지나 신문의 경우에도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면서 공동체 의식을 다룬 잡지나 신문이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황단비(행정 3) : 추가하자면 현재 “젠틀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처음에는 공동체의식을 느낄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방송을 보면 시청률을 위해 점점 상황들이 자극적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윤석(신문방송) : 황단비 학우의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요즘 젠틀맨 프로그램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미디어가 많아지려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미디어를 통해 들아가는 현대사회

최무성(신문방송 4) : 저는 온라인이라는 개방적인 공간에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자료들이 있는 사이트가 많이 개설되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트 개설과 같은 sns 활동은 젊은이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습득력도 빠릅니다. 젊은이들이 먼저 공동체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범희(신문방송 4) :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젠틀맨을 언급했을 때, 점점 자극적이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함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작자가 이러한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미래(신문방송 3) :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작자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의식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도록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이러한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방송사에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석(신문방송 4) :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라는 개방적인 공간에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자료들이 많은 사이트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사이트가 많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공동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마인드가 바로 잡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방송사에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사전교육, 시스템 구축들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화 과제 5:

국회의 입법과잉, 어떻게 할 것인가?

(제 80 차 월례토론회)

1.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강명재(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요즘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자주 보도되지요.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사건인 경우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률안을 만들곤 합니다. 일명 OOO 법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국회에 상정되고 빠른 시일 내에 졸속 처리되는 경우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국회의 과잉된 입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 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5 월 30 일부터 11 월 7 일 현재까지 19 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은 6815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19 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 년 5 개월밖에 안 되지만 이미 18 대 국회의 1 만 1191 건의 60.9%에 이릅니다.

'양'은 많아졌지만 이 중 동료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원안 혹은 수정안으로 처리된 법안은 491 건으로 가결률 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평가 시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하였고 입법에 성공하였는지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영향분석, 법안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년 간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법안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향분석의 권한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시행될 뿐 상정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엄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제도 정비로 하나의 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향분석이 힘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대중의 관심이 필요할 텐데요. 실제로 법률안을 발의했다거나 가결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이 법률이 가져올 효과가 영향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는 사람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드물겁니다.



법률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하나는 가결하기 전에 시행하는 사전 분석, 진행 중에 시행하는 병행 분석, 마지막으로 사후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법률의 영향성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법률안이 다양한 잣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스스로 예상한 결과와 비교하여 실제로 이 법률안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과 입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요?



법을 무조건 어렵고 딱딱하며, 나와는 별개인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타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을 들여다보는 눈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양상을 보는 관점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리깊게 박혀있는 사회 무관심을 타개할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꾸준한 감시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을 위한 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개인적인 실적을 위한 법도 사라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입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국회의원 스스로의 소명의식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중의 감시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시민 교육과 더불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여러 영향평가 방식을 대중에게 널리 개방하고, 시민들의 생각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결률과 과잉 입법되는 현상이 조금은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② 김영재(삼육대학교 경영학과)


너무나 많은 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입법 과잉' 문제

국회에서 쏟아지는 법에 대한 '입법과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 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률안의 숫자는 총 7536 건으로 이를 제대로 심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법과잉의 해결을 위해선 법률안의 숫자 자체를 줄이는 것부터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법안 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의원을 평가하는 관행을 들 수 있습니다. 공천에서 법안 발의 건수를 반영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들도 발의 건수가 적은 것을 국회활동을 못한 것처럼 평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법안을 내고 보는 성향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자신의 법안 발의 건수가 중요한 의미이기에 미흡한 검토와 준비로 인해 국회 통과 후에도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발의부터 논란이 되는 법안들은 이런 부분에서 더욱 걱정스럽기 마련입니다.


좋은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4 대 중독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내용의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한 부분입니다.

게임중독법에 대해 아이들의 게임중독으로 수백 만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찬성 측의 입장과 창의적 문화콘텐츠를 마약 취급해선 안 된다는 반대 측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게임중독법의 국회 통과 여부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게임을 통제하고 중독자를 치료해야 하느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토론은 생략된 채 오직 게임을 마약과 같은 차원의 중독으로 봐야 하느냐를 둘러싼 감정싸움만이 더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게임이 중독을 인가의 여부보다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 되어야 한다.(이미지 출처 : MBC NEWS)

인터넷 게임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핵심 소프트웨어 산업이며 국가 경제에 대한 공헌도로 치자면 향후 반도체, 자동차 정도의 수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독 방지를 위한 법령이 과도한 규제로 연결돼 건전한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심각한 사회 부작용을 유발하는 요인이며 중독 측면에서 보자면 그 해악이 술이나 마약보다 절대 덜하지 않기에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성장기 청소년들이 게임으로 멍들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은 더더욱 안될 일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관련 기업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과 기술에 대한 사회적 영향과 부작용을 충분히 연구하고, 예방과 치유책까지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법안이 발의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은 그 역할을 국회의원들과 기업이 함께 수행하여 기술 발전과 중독 예방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 국가에 이익이 되는 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③ 김우갑(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입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입법이 국가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닌 숲을 보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 대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 분야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 민주화입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하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 없이 잘 살게 하자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요점입니다.

19 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5 개월 간 4 천 567 건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국회의원들은 이것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입법되어야 할 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등 특정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입법되어야 할 법들이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법안들이 있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무형 문화재 전수 지원 관련 법안입니다.

현재 무형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보존과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수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은 2001 년에 개정되고 그 후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전에 있었던 20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 중요 무형 문화재가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승자와 계승자가 무형 문화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무형 문화 전수가 효율적이지 못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현재 중요 무형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중요 무형 문화 전수 관련 지원금은 전수자가 월 평균 140 만원, 계승 받는 전수 조교는 월 평균 70 만원이라고 합니다. 한 무형 문화재의 말에 따르면 여기에서 재료비나 활동비를 제외하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젊은이들이 돈 벌이가 되지 않는 무형 문화를 전수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계승자 대부분이 60 대 이상의 노인분들이라고 합니다. 전수를 받기 위해서는 전수장학생부터 이수자, 전수조교까지 보통 15~20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70, 80 세가 되어 무형 문화재가 되어 얼마 안 있어 은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면 어떤 분야에서는 무형 문화재가 한 명도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한국 전통 문화 빼앗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우리 전통 문화를 그냥 가져가라는 격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기조 중 하나로 문화 융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 문화가 쇠퇴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 융성은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입법이나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비단 무형 문화재 전수 지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야더라도 국회의원들은 더 나은 국정 운영을 위하여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닌 숲을 보는 입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④ 김재혁(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상생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되었다

올해 초 대선공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큰 이목을 끌게 된 경제민주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가진자들을 좀 더 위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진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적·제도적 정비를 해나갔고 국가는 대기업 위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해왔죠. 그 결과 우리는 짧은 시간에 믿기힘든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작지만 강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국민 합의이자 공감대가 형성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제 민주화의 목소리도 높아져 갔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변화된 우리 시대속에 분명 실현시켜야 할 모습입니다.

다함께 상생하고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경제 기반속에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속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과잉 입법,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중에서 현재 경제민주화와 관련되서 쏟아져 나오는 과잉 입법 발의안들이 그 대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경제민주화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해놓고선 이게 무슨말인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유를 간단히 논해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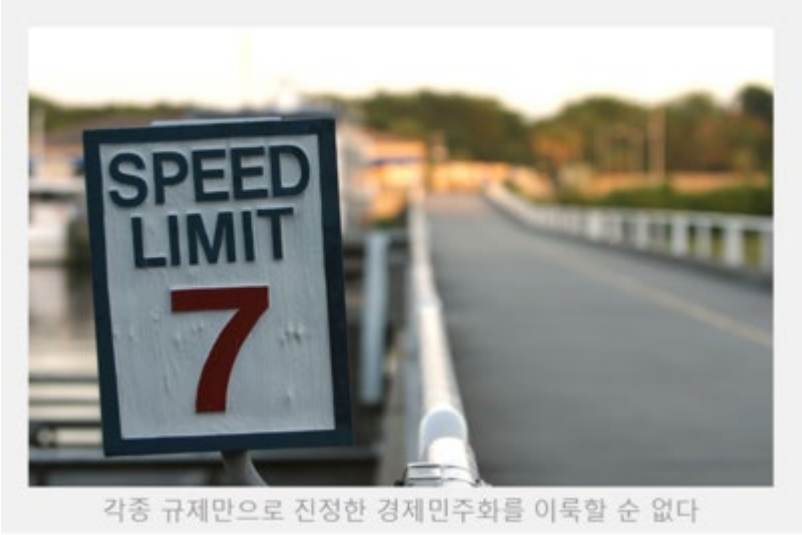
우리들이 각종 뉴스를 비롯해서 알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대부분 규제 위주의 법안들입니다. 기업 옥죄기식 법안들이죠. 물론 그 기업들은 대기업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순환 출자 금지 법안, 그리고 남양유업 사태로 주목받은 남양유업 방지법(이른바 밀어내기 처벌강화) 법안 등이 그 예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경제 민주화를 위한다는 법안이 수두룩하고 해마다 1000 여개씩 각종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이룩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경제 민주화를 위한답시고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일자리 축소와 경제 퇴보의 악순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의심됩니다. 실제로 7 월에 대한상의에서 조사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 대해서 중소기업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54%나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죠. 경제 민주화를 위한다는 본말이 전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대한상의에서 대기업 149 사, 중소기업 153 사 등 302 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제 민주화 입법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으로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 기업 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 기업정서 심화(11.3%), 소비자 피해 발생(5.3%)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각종 규제만으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순 없다

이렇듯 경제민주화를 위한다는 법안들이 규제 위주의 내용들이고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들을 일방적으로 감싸주자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남양유업 사태처럼 밀어내기식 경영과 같은 부분은 분명 약자인 '을'을 위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모습이기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업 등이 자기 협력업체의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한다거나 갑을 관계를 이유로 계약을 손쉽게 폐기하는 등의 악덕하고 방만한 경영은 지탄받아야 하고 규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일자리 축소 등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힘든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적 과도한 경제 민주화 입법 발의는 국가를 위함이 아닌 그들의 이해관계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우리들은 주의깊게 관찰하고 어떠한 원인이 무슨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하여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과도한 입법 발의는 과유불급이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최종목표이자 이상입니다. 이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제민주화 법안, 과유불급해선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제민주화라는 본말(本末)을 전도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⑤ 김재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과)


국회는 예산안 문제, 입법과잉 등으로 시끄럽습니다.(출처:한국선진화포럼)

올해도 국회는 예산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합의는 커녕 격렬한 논쟁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입법을 추진하여 경제, 행정 등 여러 문제를 양산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의 입법과잉,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입법과잉의 한 실례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법 개정안을 들 수 있습니다. 2012 년 개정된 이 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나 그들로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 모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합니다.

이는 잦은 아동성범죄가 일어나는 요즘 필요한 법으로 보입니다. 일요시사에 따르면, 이로 인한 적발 건수가 전년도 대비 30 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상당수가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무심코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하다 적발된 것이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법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범죄자로 취급되고, 경찰들까지 사소한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진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결국 억울한 누명을 만들 뿐 아니라 아이들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역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많은 법들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다며 불만을 가집니다. 도로건설 업무를 담당하던 한 공무원은 도로 하나 건설에도 지역별로 걸리는 법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과잉입법이 빨리 해결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불이익을 가져온 과잉입법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해결책은 '거버넌스(governance)'입니다. 이는 시민주권을 강화하여 정부와 시민사회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스스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효율성과 대표성, 민주성 등을 중시합니다.



타운미팅을 통해 주민들이 의견을 공유합니다.(출처:한국선진화포럼)

이 덕에 실제로 최근 많은 정부들이 거버넌스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례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타운미팅'이 있는데요. 이는 정부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민주정치를 통해 그 안건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많은 주는 주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 시민들 스스로의 만족도도 매우 높죠. 또한 영국도 거버넌스를 시행합니다. 빈곤층을 중심으로 거버넌스형 마을을 만들어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정부와 시민 간의 협력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유럽국가들도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입법과잉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는 한 유럽국가의 정책평가입니다. 이 곳에서는 전문기관이 한 정책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 모두에게 공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됩니다.

이처럼 국회의 입법도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 혹은 검열을 통해 보다 정당성을 획득한 법안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실현방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입니다.

이는 ㈜프리덤팩토리에 의해 만들어진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시민위원들은 전문가위원의 평가서를 바탕으로 법안을 심의 및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회의원에게 권고안을 발송하죠.

이 시민위원들은 다양한 가진 26 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 회의 심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33 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제도화된다면, 입법의 내용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획득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현 트렌드에도 가장 맞고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출처:한국선진화포럼)

그러나 이 제도에도 보완해야 할 점들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실제로 이 위원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적으로도, 연령별로도 다양한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을 다량으로 만들어 내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별로 상충되는 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지역 별로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지역의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보다 전국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도 별로 혹은 시 별로 위원들이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인정할 만한 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령대의 다양성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어린 학생들이 법을 무엇을 알아 그들을 이런 위원에 투입하냐 할 수 있겠지만, 교육과 관련해서는 웬만한 어른들보다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양주시 차세대 위원회' 입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양주시의 다양한 청소년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제로 집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는 이 아이들이 전문가인 것이죠,

따라서 다양한 법안이 그 안건이 되는 것처럼 그 위원들 또한 다양한 연령대여야 합니다. 그 법안에 적용을 받는 연령대가 전 연령이 아닌 법안도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다양한 연령, 직업, 지역 등이 반영된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회는 전문성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도 그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보다 더욱 전문성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실제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위원들이 각 법안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겠지만 시민들이 무지하다면 그 평가서를 비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 전문위원의 꼭두각시들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시민들이 본격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안건의 장단점과 분석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이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의 기본취지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몸싸움을 하는 의원들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민위원회에 참가했던 한 학생의 블로그에 올라간 글을 보니, 그 학생은 이를 교육의 기회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공식적인 교육을 해준다면 배움에 뜻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결국 과잉입법은 여러 국민의 노력과 참여가 있어야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과잉입법은 여러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본래의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다함께 이를 정정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국민의 도움이 국민의 대표를 만듭니다. (출처:한국선진화포럼)

⑥ 김혜인(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게임 중독을 관리하는 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국회의 입법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불필요한 법안이 과도하게 발의되고 있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이슈인 분야는 산업 규제, 특히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법안의 내용은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과 더불어 게임을 4 대 중독 유발 물질로 지정, 관리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합니다. 이는 게임중독법이라고 불리며 국민들 사이에서 거센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법안은 실질적인 규제 조항이 담긴 법안은 아닙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이 법안은 게임 산업 규제법이 아닌 중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자는 의미의 기본법이다' 라는 해명을 한 바 있구요.

그런데 왜 이 법안이 실질적 규제 법안인 셧다운제나 쿨링오프제보다도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법안이 게임 중독이 아니라, 게임 자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그 의미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중독' 이란 유해물질에 의존증이 생기는 현상을 뜻합니다. 즉 게임중독법은 게임 자체를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유해 물질로 간주한다는 것인데요.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마약과 같은 유해 물질로 간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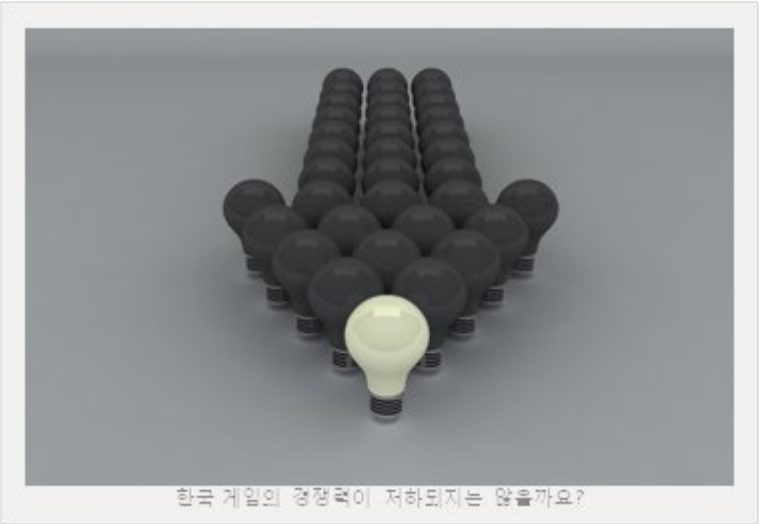
이러한 견해와 관련해 박재동 한예종 교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그 대상을 접하는 사람들을 중독(매혹)시켜야 하며, 그것은 콘텐츠 생산자의 사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화적 컨텐츠에 대한 중독과 물질 중독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은 문화 컨텐츠를 과연 사람들이 반길까요? 재미가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책은 팔리지 않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갖지 못했다면 한국 게임 산업은 순수출액 26 억 달러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문화 컨텐츠의 중독적 요소는 알코올이나 마약에 들어 있는 유해 성분이 아니라 컨텐츠의 성패를 결정하는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게임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거세한다면, 이는 세계 온라인 게임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게임 산업을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그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 아닐까요?



한국 게임의 경쟁력이 저하되지는 않을까요?

이 법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점은 국민의 자율권을 국가가 제한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섭취를 규제할 수는 없듯이, 게임을 하는 행위 자체를 국가가 규제하는 것 역시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에 대한 제한, 이용 연령 제한 등의 관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유해 물질로 규정하고 애초에 선택을 제한하기보다는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라는 차원에서 법안에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한보다는 사후적 치료와 관리 차원에서 법안에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게임중독법이라는 법안은 게임이 물질이 아니라 문화 컨텐츠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 후 발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자유권 보장이라는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재검토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이는 곧 '입법 과잉'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 발의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전제하고,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를 검토한 후 신중하게 발의한다면 불필요한 법안이 과도하게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게임중독법’ 과 관련한 파장은 국민들이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게임중독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법안이 불러올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려해 보고 법안을 발의 ·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국회가 불필요한 입법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초석입니다.

⑦ 백주아(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근 들어 ‘국회의 입법 과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법안은 규제영향평가 과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정부 제출 법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결률이 높습니다. 엄격한 영향평가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 졸속적으로 마련된 입법안들 때문에 붉어지는 문제들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한 해 수 천 건씩 쏟아지는 의원입법안 가운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업 규제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법안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라는 기치를 핑계 삼아 과도한 기업 심사와 기업 규제를 포함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각종 기업 규제 법안 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입법안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있는데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단말기 유통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입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미지 출처: Youtube)

'호갱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호갱님은 '호구'와 '고객님'을 합친 말로 휴대폰 판매직원의 꾐에 쉽게 넘어가는 손님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개선법안의 핵심은 이러한 호갱님들을 보호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가 동등한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단말기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보조금 액수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굳이 복잡한 보조금 체계에 대해 미리 알아볼 필요도 없고, 몰라서 손해 보는 어수룩한 피해자들의 원성이 잦아들긴 하겠죠.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들의 원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경쟁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개별 기업들은 가격이나 상품 등을 차별화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요.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차별화된 재화를 통해 소비자들은 효용을 얻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러한 기본적 시장의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단말기 유통 개선법이 명시한대로 강제적으로 동일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만드는 것은 제조사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이는 억지로 기존의 경쟁 창구를 막아 기업의 이윤 창출 통로를 차단하는 일이니까요. 애당초 쓸 데 없는 개입이라는 말입니다.


개선법을 시행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법안에 명시된 조항 중에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이동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을 제한하는 항목과 단말기 판매량과 출고가가 명시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전부 철저한 규제의 항목들이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도 이 정도로 심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나라 단말기 제조업체는 위에 명시된 규제들을 적용받게 되는데 반해 애플과 같은 외국 기업은 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우리 시장 안에서 활개치는 동안 우리 기업은 규제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화와 더불어 부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의 쟁쟁한 기업들과의 냉정한 승부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할 일은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할 텐데요.

심지어 세계적인 경제 추세가 불필요한 규제들을 줄여 자유로운 경쟁 구도를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시대의 흐름을 catch-up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할까요?

세계경제포럼(WEP)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꾸준히 20 위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 부담 정도가 117 위(144 개국 대상)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만 보아도 한국의 규제 경쟁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그 수준 또한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내수시장에서 기존의 단말기 유통환경을 개선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기존에 해결하려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정부의 기업규제는 물론 필요합니다. 단 규제는 고객을 호구로 생각하는 판매직원과 같이 위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잘 마련된 시장의 물을 흐리는 기업에게만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밖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불필요합니다.

규제의 목적은 시장의 흐름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야 합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규제에 대한 충분한 영향 평가도 없이 강행한다면 이동통신사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역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개선법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없앨 수 있는 당장의 눈 앞의 문제가 해결될지는 몰라도 차후에 잇달아 발생하게 될 다른 차원의 위험의 정도는 어느 누구도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간소화된 절차로 마련된 입법이니만큼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⑧ 손계준(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국회의 여러 기능 중, 입법기능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국회는 국민대표기관, 입법기관 및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하여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심의하여 이를 현실화시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을 우리나라 국회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8 대 국회에서는 4 년 동안 총 13,913 건의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7,220 건은 발의만 하고 법안처리절차도 진행하지 못하여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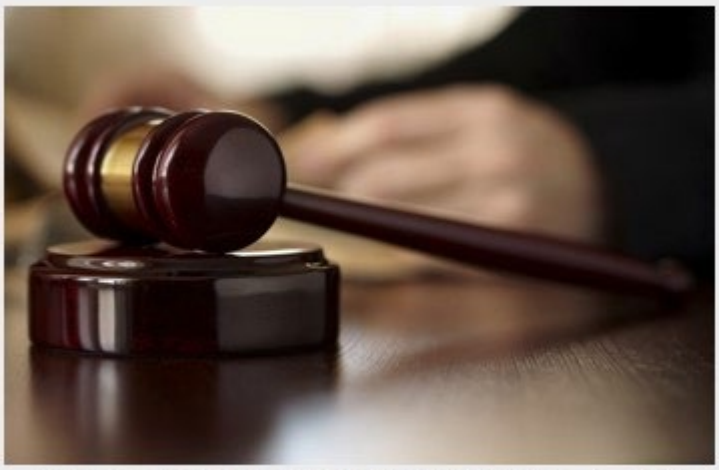
특히 법안의 완성면에서 보면 국회에서 제출한 총 12,220 개의 법안 중 1,663 건만이 가결되었는데요, 이처럼 법안의 폐기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발의된 법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국익을 우선하기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시되는 풍조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권력의 행사와 국가의사의 결정이 궁극적으로 '입법'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상정과 이의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입법의 비율이 행정부에 비해 국회가 기형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의원입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나치게 많은 수의 법안들이 세세한 검토 없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의원입법 '부실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문성의 결여'와 '이해관계와 당리당략 문제'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다수의 법안들이 의회에서 발의되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법안들은 행정부에서 발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정부제출 법률안은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치밀하게 준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날 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들 때 치밀함이 없이 제한된 정보에 의존하여 '하나는 보고 둘은 못 보는' 법안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회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로 법안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둘째로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입법에 대해서는 법의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거나 국민전체 이익에 반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데요, 국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선서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한다기 보다 '정당'에서 정한 당론에 따라 의원발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하향식'의 의사결정체계는 소신정치를 힘들게 하고 의원들의 자율적이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입법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법자로서 국회의원의 입법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유권자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국익에는 반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선출하는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선 상황에서 그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유권자들도 분석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입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교육과정'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의원들만으로 법안이 제정될 경우 타당성과 보편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외부 전문가 및 시민협의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법안에 대한 조사를 하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토의를 통해 수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 쪽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양보다 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질 높은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⑨ 송현지(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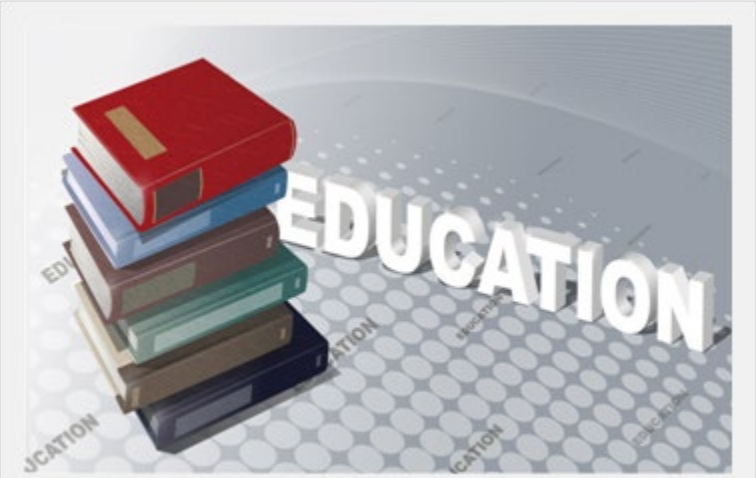


여러분, 혹시 '시간선택제교사(정규직 시간제교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는 정규직 '일반 교사'나 일정 기간 동안만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기간제교사'와는 달리 기존 근무시간의 절반의 시간만 근무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여러분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의 담당 선생님이 하루에 4 시간만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제교사라면 어떤 생각이 들것 같으신가요?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에 따라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최근 도입하기로 발표한 시간선택제교사(시간제교사) 제도가 최근 교육계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인 하루 4 시간(주 20 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하거나 월·화·수는 오전, 목·금은 오후 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규직 시간제교사 채용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 년 2 학기부터 2017 년까지 3600 여명의 시간선택제교사를 채용할 방침입니다.



시간제교사의 입법으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출처:한국선진화포럼)

이러한 교육부의 입법 예고에 교육계는 발칵 뒤집혔고, 보수와 진보진영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예비교사까지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해당 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는 특히 홈페이지에 "선생님은 하루 4 시간 근무, 월 130 만원(9 호봉 기준)짜리 알바가 아닙니다"란 홍보글을 통해 시간제 교사제도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시간제교사 제도를 반대하는 3 가지 이유로 "하루 4 시간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잦은 교원이동으로 학교운영 파행, 수업준비 및 연구시간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우려, 시간제 교사는 행정업무와 담임업무 담당이 불가능해 정규교원의 업무부담 과중과 교직사회 분열 초래 등을 들고 있습니다.

교육대생과 사범대학생 등 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사들도 시간제교사 제도 도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21 일부터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시작한 반대서명은 11 월 30 일을 기준으로 수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대 사범대 4 학년 A 씨(26. 남)는 “교사가 꿈인 예비교사들이 고작 ‘알바교사’나 되려고 사범대학에 들어와 죽어라 공부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진정 학교현장의 교육발전을 위한다면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정규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사의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일 텐데, 대체 왜 이렇게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법안이 교육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새로운 입법으로만 개선점을 찾으려 하는 과잉입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부는 진정한 학교현장의 교육발전을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고용률 70% 로드맵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이를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느 직업들과 똑같다고 판단하며 이 정책을 적용한 것일까요?

현재 국회의 과잉입법으로 인해 교육에 관련된 법안들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졸속 처리되곤 하는데요, 그 결과 앞서 살펴본 시간제교사 논란을 비롯해 교육계에는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단편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역동적 공간입니다. 비록 정부의 큰 정책기조 아래 교육제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저 정부나 국회의원이 요구 자료를 통해 학교현황에 대해 단편적으로 조사한 후 일부 표면적 사태를 문제 삼아 입법으로 규제 및 해결하려 하는 것은 학교 현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그저 법으로만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입법 및 법안발효 후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한 법안을 또 폐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으니 또 다른 법안을 상정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시간과 돈과 국력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발표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14,988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개혁 우선입법과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 년 새 국회가 구성되었을 때, 전국의 교사들이 새 국회들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교육관련 입법과제로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서열화 폐지, 집중이수제 폐지, 학교평가 및 시범학교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애초에 입법과정에 있어서 학교현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오랜 준비기간이 있었더라면 교사들이 폐지를 시급하게 외치는 법안의 수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법안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기간 숙고하여 훌륭한 교육법을 만들어야 한다. (출처:한국선진화포럼)

법을 통한 교육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분야도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과잉 입법, 졸속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토대로 하고 다양한 교육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오랜 기간 숙고한 뒤 만들어 낸 훌륭한 교육법 하나가, 우르르 쏟아 낸 수십 개의 불필요한 법안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국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⑩ 이동석(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055.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18 대 국회에서 연평균 제출된 의원 발의 법안 숫자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지난해 5 월 개원한 19 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약 7536 개, 하루 10 건 이상의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의회정치에 한해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독일과 비교하면 더욱 무더기 법안 발의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의원들의 5 년 간 발의 건수는 264 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 법안 발의 수준은 남발을 넘어 무차별 살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제출된 법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법안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는 법안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 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통신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통신기기의 부작용을 없애고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은 일선 학교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법안을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뿐만 아니라 방과후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탁상공론 식의 졸속 법안이 계속 제출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국회의원에 선출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공천 과정에 중요 심사 항목이 바로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입니다. 다음에서도 당선되기 위해 전체국익이 아닌 지역구만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 결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발의를 위한 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명령적 위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국익에 반한다면 그 목소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재선, 삼선 욕심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법안을 제출하고 나면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행정부에 무작정 위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 법안을 실행해야 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법령보다 밑에 있는 대통령령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공포하고 집행해야 하지만 현대 국가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입법이 증대되고 있고 법률만으로는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의 법안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위의 열거한 많은 문제들,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 권한을 행사할 때 행정부가 법안 제출할 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권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부의 모습을 보고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행정부에서 법안 발의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행정부에서 법령 안을 입안하고 나면 가장 먼저 부패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마저 완료한 법안들은 이제 입법이 예고되는 한편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는 차관회의에서 심의하고 나아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국회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수많은 토론과 수정을 거치면서, 또한 전문성과 현실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부에서 제출된 법안과 국회에서 졸속으로 제출된 법안과의 질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19 대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 발의 건수를 비교해보면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안 수가 행정부의 법안 발의 수의 무려 14 배라고 합니다. 즉, 국회의 무더기 법안 발의 역시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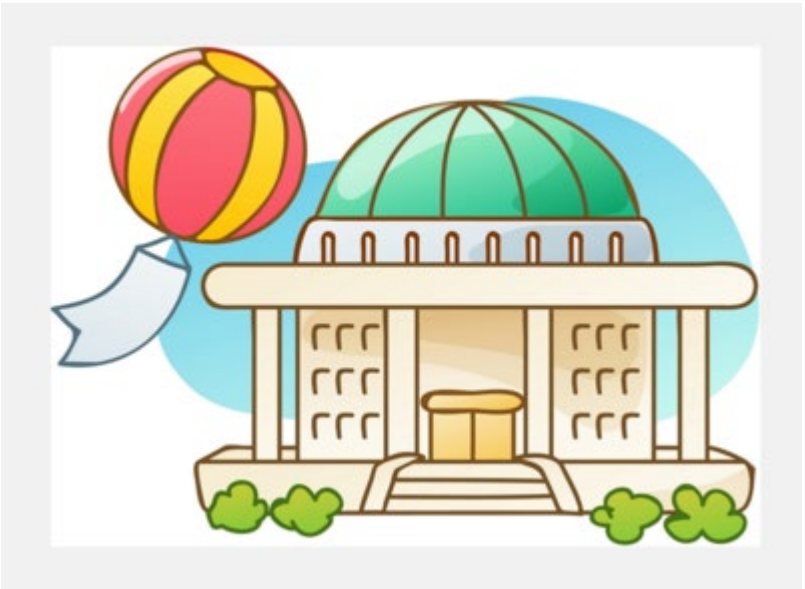
국회는 법안발의에 앞서 행정부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출처: 천진화프림)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입법부에서 법안을 발의하기까지의 과정을 행정부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꼭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의 무더기 발의 역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법안 발의 과정을 따라 한다고 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입법부를 입법부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즉, 입법부가 자신들의 가장 큰 주요 역할인 법안 발의를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국회가 자신들의 주요 권리인 입법권한을 사용할 때 행정부의 모습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회의 입법과잉 문제는 물론, 규제뿐인 법안, 졸속 법안을 막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⑪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선진사회가 정착되고 나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국민들이 제안한 의제들 중 바람직한 것들이 잘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문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역행하는 의원평가제도입니다.

의원평가제도가 법안 발의건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기가 제한되어 재선을 원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법안 검토 없이 통과 법안 숫자를 늘리는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임기 내에 인기를 얻어야 재선이 쉽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민들만을 위한 부당한 입법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진시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란 집단지성을 올리는 일입니다.

집단지성이란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를 통해 사람들이 지식 등을 공유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지식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올라가서 경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면 투표율이 올라가고 토론이 활성화되면서 편파적인 입법을 하는 의원들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예로 서울시의 정책토론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서울시의 중요 현안이 무엇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를 시민들에게 직접 듣고, 정책을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의 존재로 인해서 서울시 내의 특정 지역 이해집단 세력들의 부당한 입법 추진 등이 저지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지성을 통한 규제는 행정기관의 개입이 아닌 시민들 자체의 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있어서 시민 자발성이 돋보이며 선진 사회의 이상적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지성이 국가 전체적으로 더욱 강화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오락물, 대중매체보다 수준 있는 교양물, 시사토론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⑫ 이효정(서울대학교 불어교육학과)



영화 '도가니'의 포스터 (출처:티스토리)

2011 년 대한민국을 분노로 들끓게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주 인화학교를 실제 배경으로 한 영화 '도가니'입니다. 장애 아동들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특히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인화학교 교직원 김모씨가 구속되었었는데, 2006 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돼 풀려난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는 대한민국을 '뿔'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영화 개봉 이후 재수사에 착수하여 김모씨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도가니법’이란,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으로 이들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 뒤늦은 대처입니다. 언론과 SNS 등의 매체들을 통해 여론이 폭발하자 그제서야 법안을 개정하고 급히 통과시키는 모습들은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국민들에겐 단순한 정치 포퓰리즘적 행동으로 비치며 불신을 낳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 두 차례가 아니다 보니 국민들의 대표로 뽑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영이 사건' 이후 사후약방문 태도에 분노한 국민(출처:hiastro.com)

‘나영이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몇 해 전 경기도 안산에서 조 모씨가 등교 중이던 당시 8 세의 여아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여 성기 및 항문을 영구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고 온 국민은 치를 떨었습니다. 국민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했고, 흉악범인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 반감의 목소리를 크게 내었습니다.



국민이 여론이 거세자 '조두순법'을 급히 통과시킨 국회(출처:구글)

제 18 대 국회에서는 '조두순 법'으로 불리는 상습적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치를 보는 뒤늦은 대처라는 국회를 향한 불신의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가 모인 자리니까요.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뒤처리에 급급하다'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의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관해선 아주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마약 복용이나 음주 후 성폭력을 하는 것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건강한 국회의 활동을 기대한다 (출처:구글)

국회의 사후약방문식 법률안 개정 및 통과 관례를 이제는 고쳐야 할 때입니다. 우선 순위를 파악하여 사전에 준비할 때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회가 활동할 것이며 그럴 때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입니다.

⑬ 임성현(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불필요한 법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9 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국회의 입법 규제 과잉을 막기 위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 같지 않은 법을 만들려는 의원들의 입법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입법 과잉 문제를 거론하기 앞서 무작정 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국회의원들의 능력이나 판단력이 제대로 있었다면 입법 과잉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러한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에 현혹되어 그 사람의 자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우리 국민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에 무조건 투표하는 우리 국민들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국회의원만 지지하는 이러한 이기주의는 크게는 국가적인 사업부터 작게는 지역내의 사소한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최근 대선을 통해서 포퓰리즘 정책에 현혹된 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월 소득 130 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요의 전액 정부 지급 약속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재정상 이행하기 힘든 정책임을 인정하고 공약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실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실망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이러한 정책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투표를 했겠지만 과반수가 넘는 득표수로 당선이 되었다는 점은 투표를 한 우리 국민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망하고 원망해야 할 존재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 아닌 우리 국민들 스스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의 한계를 인정하고 철폐한 것은 국익을 위해 칭찬받아야 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포퓰리즘 정책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종 선심성 정책이 아닌 후보자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눈은 계몽운동과 장기적인 교육 등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 연대의식, 관용, 자유와 권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프랑스 시민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생각하게 해주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진행되는 시민교육을 통해 프랑스 국민들은 자신들이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지 배웁니다. 또한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프랑스 시민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과는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보다는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을 받은 우리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민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범국민적 계몽운동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몽운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인식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회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더 이상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유도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입법 과잉 문제와 더불어 국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 원인이 국회의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교육과 계몽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면 국회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교육기관은 물론 국민들도 노력한다면 우리 정치도 선진 정치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⑭ 김광래(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경제민주화와 국민 대통합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 간의 이익균형과 공정경쟁이 선결과제다.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사익과 사익, 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에 따른 분쟁, 갈등이 심화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또한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의약분업과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른 갈등과 반목, 대립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협회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익집단이자 사회지도층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들 만의 법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 해왔다.

그런 그들이 진료거부나 약국 휴폐업을 무기로 수년 동안 갈등, 대립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국가의 정책수행을 저지했다. 로스쿨제도 도입을 반대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최근 정부의 미국식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변호사와 반대하는 변리사의 갈등도 그들 나름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익 간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PC 방 등에서의 흡연금지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금연법)이 금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독의 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4 대 중독법)'은 입법을 앞두고 게임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동상생 할 수 있는 법률안이 필요하다.

공익적 측면을 강조한 이러한 법률은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관련업계의 줄도산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는 게임업계가 '4 대 중독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중국은 지난 2000 년 강제적인 규제를 시행했으나 오히려 범죄율이 증가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산 게임이 시장을 크게 잠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2010 년 자율규제로 방향을 바꿨다. 미국과 일본 역시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현대 민주국가의 이익집단은 강력한 정치적 압력단체다. 따라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강제 규제하려는 시도는 문제해결보다 새로운 갈등과 사회불안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금연법이 시행된 금년 6 월 1 일 이후 많은 영세 PC 방들이 문을 닫거나 경영상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법의 시행은 영세자본으로 창업한 소형 PC 방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법률을 제정하기 전 반드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 보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형식적인 공청회보다 최근 사법부에서 도입한 배심원제도처럼 이익집단과 관계 전문가, NGO 를 비롯한 시민대표 등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갈등해결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MF 당시의 노사정위원회와 사법부의 배심원제도를 혼용한 갈등 방지 및 조정 기관을 설치하여 예견되는 문제를 미리 걸러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저마다 욕구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그만큼 다양한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이 각 이익집단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갈등 또한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처럼 급격한 산업화과정을 겪고 있는 국가로서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익집단 간 갈등조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입법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여 이익집단 간의 갈등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⑮ 김민정(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국회의원의 발의 법안이 넘쳐나고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지난, 18 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의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그에 따른 규제 법안들이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쌓이는 1000 여개의 규제 법안들은 국민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의회의 입법기능이 강해지면서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했다”며 “동시에 과잉 입법의 우려도 커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2000 년 16 대 국회에서 4 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651 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점차 증가하여 17 대 국회에서는 5728 건, 18 대 국회에서는 1 만 1191 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19 대 국회는 1 만 7000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는 월평균 350 건꼴입니다. 19 대 국회에서 논의한 법률안의 15% 정도가 규제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국규제학회가 19 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 법률안 474 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에서 평균 2.99 점(5 점 만점)을 받았고, 규제 수단의 적절성’ 점수도 2.92 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안이 신중한 검토 없이 발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경우 전문가들의 규제영향 분석 등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도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안제출이 가능합니다.

규제관련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지출 없이도 정부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 입법을 의원 입법으로 슬쩍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대기업 규제 등을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부작용으로 다양한 규제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출처: 구글)

경제민주화는 지나친 양극화 현상으로 소외된 국민을 위해 시작된 규제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너도나도 법안을 남발하며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법안들 때문에 국회의 입법 처리 지연도 시장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규제 법안을 줄이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과잉 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극적인 법안이 아닌, 국민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절한 법안을 만들어 내는 국회의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출처: 구글)

국회의원이 되면 그에 따르는 모든 혜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혜택들이 놀고 먹는 의원이나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 의원이 동일하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의정성과 없이 계속 국회에 머물며 혜택을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생겨 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끊임없는 능력경쟁과 그에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에 부합하는 질 좋은 정치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보수를 기본수당·의정활동비·회의수당으로 세분화하여 자급한다면, 지금처럼 국회가 장기 공전할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회 파행과 장기 공전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성과급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인재의 충원이 용이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정치권 물갈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정치자금이 나가는 지금의 구조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일한만큼 받는 성과급제가 필요하다.
(출처: 구글)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과 국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규제정책들, 게다가 국회입법이 지연되는 현상까지 우리의 국회는 제 위치를 잃은 채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도 개혁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성과급제도가 시행된다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입법이 되지 않을까요?

⑯ 김수창(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한민국 입법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이 처음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법원’ 이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마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은 ‘국회’ 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익히 배워서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40 조를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52 조에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입법에 있어 행정부인 정부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을 압도적으로 앞서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실제로 가결되는 법률안은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문민 정부 시기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 (321 건)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수 (589 건)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가결된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는 119 건으로 무려 30%를 상회하는 가결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 자료에 따르면 참여 정부 시기인 17 대 국회부터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이 2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지난 18 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건수가 12,220 건인데 비해 가결건수는 단 1,693 건으로 겨우 13.6% 의 가결률을 보이는 데 불과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국회에서 제출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80% 이상이 폐기된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동일 시기에 정부제출 법률안은 1,693 건 제출에 690 건 채택, 약 41%의 높은 가결률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정부제출 법률안과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제처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정부제출 법률안은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을 거치는 반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심사의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국회에서 제출되는 의원발의 법률안 중에서는 특정 이익 집단에게 유리한 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하거나 애꿎은 국민들의 삶에 규제를 가할 수도 있는 법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46 조 제 2 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입각한 법률의 양산은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특정 집단이나 조직의 이해관계가 담긴 것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이 낮다고는 하나 이것이 아주 걸러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결로 이어지는 법률안이 많다면 이는 국가 공익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의 이러한 입법 규제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을 입법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국민들을 입법 규제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법률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입법절차에의 국민 참여 방안'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 58 조 제 6 항에서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고 하여 위원회에서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는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부의 잘못된 법률안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 누구입니까? 바로 애꿎은 국민들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법률은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법률이 아닌 이상은 거의 모든 법률이 공청회를 거쳐서 입안이 되며 시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입안되는 법률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미국의 입법 과정에서 법률 폐기율이 10% 가 채 되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지요.



활발한 국민 공청회 속에서 10% 미만의 법률 폐기율을 보이는 미국

진정한 입법 과정에서의 민주화를 이룩하여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 과는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제출된 의원입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및 청문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법률안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국민들을 ‘공청회’ 라는 입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불필요한 법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줄이고 공익 실현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만 발의를 함으로써 입법부와 국민의 소통을 통한 입법 과정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1987 년 민주화 선언 이래로 이제 대한민국은 어언 30 년 동안 명목상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입법 과정에도 활발한 국민 참여를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국민의 3 자간에 온전한 신뢰를 쌓아 보다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⑰ 김한결(강원대학교 일본학과)



입법과정, 여러분은 얼마나 알며,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특별법을 알고 계시나요? 일반법과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는 의미인 '특별법(特別法)'은 일반법보다는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계층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을 말합니다.

지난 4 월 발의 된 '차(茶) 산업 발전 및 차(茶)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특별법의 사례로서 커피와 인스턴트 음료에 의해 국내의 차(茶)산업이 위협을 받게 되자, 농가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발의 된 특별법안 입니다.

이러한 특별법안은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19 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률안의 숫자는 총 7.536 건으로 이 중 80%가 특별법이라고 하니, 일반법보다 특별법 법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이여야 한다는 법의 기본 정신이 지켜질때에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특별법의 경우 특정 계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집단과 개인을 위한 법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국내의 차(茶)산업과 관련한 특별법에서도, 이미 농가에 관한 충분한 재정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일반농가와 차(茶)농가를 차별하는 법률안으로 법질서의 '보편성'에 어긋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의 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회의원들은 이를 덮기 위하여 법의 보편성은 사라지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들이 법률로서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과잉입법안의 문제는 발의 된 입법에 관한 국민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입법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만 입법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이 알지 못하는 법안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실시한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공감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국민참여의 의미에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직접투자유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주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법안' 등 제주시에 꼭 필요하며 제주도민 누구나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법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법률을 재정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좀 더 공정하며, 누구에게나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법의 근본적인 필요성은 '국민의 평등함'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입법 과정은 국민의 생각과 의견은 도외시 된 채, 소수의 특정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국민은 법에 대해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법은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성격을 잊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며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통해 국민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법이 될 때에 우리 사회는 선진사회로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삶속에서 살아 숨쉬는 법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⑱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특별법 발의가 필요하다(출처:선진화포럼)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특정사항이나 사람, 특정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통해 일반법보다 우선시 적용되고 있는데요.

지난 3 일에는 19 대 국회의원들이 사회 취약계층보다 자기 지역구민만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지난 18 일까지 통과시킨 특별법안은 45 건, 계류중인 특별법안은 289 건인데요.

이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특정집단과 특정지역의 이익만을 고려한 법안으로서 포퓰리즘 법안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한 반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안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부처 간의 과욕으로 기본법으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한 부분까지 발의한 특별법이 많다는 비난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특별법 남용은 사법시스템 전반과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사실상 그 권한의 힘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용의 문제가 붉어지는 것일 텐데요. 특별법 발의 남용으로 붉어져 가고 있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요?

특별법 발의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합니다. 특별법은 특정 사람과 특정 지역, 특정 상황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으로서,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되어 법이 적용되는데요.

특정 사람과 특정 지역, 특정 상황이라는 개념에 국한하여 어느 집단의 배를 불리기 위한 법안 발의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노인층과 같은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법안만을 발의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별법 발의의 기준이 명확히 된다면 국회의원 또한 자신의 지역구민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지역구민과 지역국회의원 간의 불투명한 관계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기반을 흔들만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흔히 언론에서 'OO 특별법 발의' 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특별법에 대한 인식은 그저 사회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도피 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 조차도 특별법 발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과정을 걸쳐 마련된 법안이 아닌 기본권과도 중첩되는 특별법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입법권을 행사할 때에도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은 권력독점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입법은 독점적인 권력행사가 아닌 시민단체와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선진화포럼)

따라서 국회의 입법권한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단독 권한이 아닌 시민단체나 대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입법과정이 필요하며, 특별법 발의안 수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발의는 특별법의 가치를 저하시키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특별법 발의안 수를 제한시킨다면 특별법 남용을 방지하고, 제한된 수 내에서의 발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법의 질 또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점점 권력의 완전체로서 변질되어 그 본연의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에 보답하기 위한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면 포퓰리즘 입법이 과연 필요할까? (출처:선진화포럼)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통해 얻은 권리를 반짝 포퓰리즘이 아닌 임기 동안 국민의 소중한 한 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이바지 한다면, 포퓰리즘 성향의 특별법 발의,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⑲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지난 해 대선을 전후하여 일어났던 택시법 파동을 기억하시나요? 여야가 30 만 명의 택시업계 종사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매년 2 조 원 가량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택시법을 통과시키며 많은 논란을 빚었는데요. 결국 유사한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국가예산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1 년이 지난 지금도 택시법 재의결에 대한 시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갖고 입법활동을 하기보다는 당장의 표를 욕심 내어 특정이익단체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려해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받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의 권한이지만 최근 국회의 입법 활동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법과 같이 표를 의식한 선거용 법안과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 법안들이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9 대 국회의 입법건수는 개원한지 불과 2 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6500 건수를 넘기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 가결된 법안은 10% 초반대로 매우 낮은 것을 볼 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실한 의원입법이 너무나도 많이 남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입법 예고와 공청회, 관계 부처 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를 미리 걸러내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같은 복잡한 사전 절차가 없이 바로 국회에서 심사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입법에 비해 신속한 처리는 가능하지만 치밀함과 완성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충분한 검토가 없는 미완성된 입법이 걸러지지 않고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의 몫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의원입법의 질적 성장을 제고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회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의원입법의 양적인 성장은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법안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숙고해 볼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은 계속해서 보장하되 입법과정의 신중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입법절차를 보편화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법률 선진국에서는 신중한 의원입법이 보편적인 경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원입법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미국의 경우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매우 다층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다소 복잡하고 신중한 입법 절차를 두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저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더욱 치밀한 자세로 국민을 항상 염두하고 법률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질 높은 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의원입법의 지원과 합리적인 입법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입법조사처, 예산처, 정부책임처 등의 기관이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각종 분석을 지원하고 있어 법률안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다 질 높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법률안의 조사분석기관을 따로 두어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자신이 제안할 법률의 효율성과 적용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고 발의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제와 사전영향평가제 같은 선진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만들고 법에 힘을 부여하는 법의 주인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 바로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법률안을 모니터링하여 잘 만들어진 법은 칭찬하고 충분한 검토 없는 부실한 법은 질책하여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보다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입법이 발의되기 전에 국회 홈페이지나 다양한 채널 등을 통해 법안을 소개하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여론을 수렴하는 사전 예고의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입법 절차의 도입과 의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지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더해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현명한 의견 표출이 보다 질 높은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원들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⑳ 채　련(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수는 100점! 그러나 가결률은 0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수가 정부의 발의 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 18 대 국회의 경우, 정부 발의안에 비해 의회 발의안이 총 12,220 건으로 7.2 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떨까?

일명 '날림발의'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발의는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대(27.0%), 17 대(21.1%)였던 국회의원의 법안 가결률이 18 대에서는 10.3% 그리고 현재 19 대에서는 7%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9 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법안 통과 '0'건에 해당하는 의원이 56%로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법안의 발의건수와 가결건수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 많은 발의 수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가결 수는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 법안을 발의했는지 가늠이 가게 한다.


심도 있는 입법과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게다가, 법안을 양으로 승부하려다 보니 심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중요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워졌다. 또한 의원의 발의안은 사전규제심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 실효성 있는 좋은 질의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의원의 법안들은 공청회나 국민의 여론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의되고 있다. 이는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법안 가결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국회의 기능을 잃게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먼저,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안에 대한 사전, 사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법에는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규범으로서 타당 근거를 엄밀히 정립하는 법이 효력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법률안에 대한 자체 심의가 매우 엄정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다층적인 심의와 분석을 통과한 법안들이 발의되며 가결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법안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와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처럼 의원 입법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보편적인 법안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입법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타당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법은 한 나라의 '질서'이자 '정의'의 표본이다

다음으로, 법안을 중요도에 따라 나눠서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해마다 국회에서는 수많은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안을 심의하려면 효율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중요한 법안이 묻힐 수 있다.

따라서 비용과 편익에 따라 법안을 나누고, 중요 법안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요 법안의 경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심사기간을 늘리고, 공청회의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에게도 무역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중요한 법안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 실질적인 법안의 효력을 받게 되는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한다.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시책을 결정할 의무가 있다.

또한, 발의하고 시행된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요구와 의견이 잘 반영되었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 감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그 질과 효율은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분석도구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내실 있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규제영향평가'를 도입 해야 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안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법안 개정하고 보완해가야 할 것이다.

법안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심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양질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더이상은 날치기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성숙한 민주주의적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은 한 나라의 '질서'이자 '정의'의 표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질서가 바로 서야 하며, 따라서 법을 만드는 입법과정의 선진화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손계준(서울지리3), 이동욱(서울경제3), 지상윤(서울지리3), 이동한(서울경제3), 박의현(서울경제3)

손계준(서울지리 3):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수가 매우 많아서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되었는지 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과연 전문성을 갖춘 것들인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이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편향된 상황을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법안의 질을 높일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의현(서울경제 3):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당'의 공천을 통해 되는데요,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은 매 선거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출마하거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즉 전문성을 보고 뽑는다기 보다는 당에서 당선될만한 인기 있는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고, 출마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입법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층적인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그를 통해 유권자들이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상윤(서울지리 3): 변호사들을 보면 그들도 '소송 승률'이 있듯이 의원들도 자신이 제기한 안건 대비 실제로 통과된 안건이 비율을 평가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법안을 발의할 때 심사숙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발의하는 법안들의 수를 통해 단편적으로 평가요소로 넣기 때문에 과잉 입법 문제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안이라고 하기도 힘들 정도로 실효성 없고 모순적인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서울경제 3): 네,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유권자가 선택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고, 입법능력을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뽑힌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부족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즉, 그만큼 의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인데요,

다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의 지식만이라도 함양하게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센터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동욱(서울경제 3):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직능대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바로 부족한 의원들의 전문성을 대안적으로나마 보완하기 위해 각 직업의 전문가들을 통해 전문적인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출마를 한다고 해도 반대로 그들이 '정치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실제로는 그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가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상임위원회나 민간 심사 기구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심사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해도 정치 과정 상에서 그 의미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시스템은 되어 있고 전문성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배분된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 풍토가 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계준(서울지리 3): 네, 여러분의 말을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유권자가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하며,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실제로 통과되는 법안들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센터를 마련하는 것과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적인 법안을 지양하고 법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지상윤(서울지리 3): 네, 저는 법안을 발의할 때 전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무기명 발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소신을 가지고 특정 내용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고 싶지만 당의 의견과 배치된다고 하여 거부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막고 소신 있는 법안들이 활발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한 뒤, 중간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법안들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질 높은 법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의현(서울경제 3): 네, 물론 당리당략적인 측면은 정당구조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갖고 있는 특정한 방향성을 해당 정당의 의원들이 일정 부분 따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신파라고 해도 당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일부 소신 있는 의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풍토가 조금 더 커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품격 있는 법안'을 등해 맡해야 합니다.

이동욱(서울경제 3): 의원들이 당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가, 또는 자신의 의견을 밀고 나가야 하는가와 관련된 이슈는 나라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의원내각제이다 보니 당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영국의 정당들을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스탠스가 명확합니다. 어떤 계급에 기반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명확하기 때문에, 만약 어느 의원이 자신의 의견과 당의 의견이 다르다면 그냥 다른 당으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만큼 정당의 기준이 명확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양당체제이고 계급적 기반이 불분명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표방해도 그 경계가 불분명한데요, 따라서 당에서 의원들을 강압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관용과 타협의 자세일 것입니다.

지역구 간의 이해대립, 정당과 이념 간의 대립관계를 보면 한 쪽이 절대 양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에도 이러한 대립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좋은 법안들이 폐기되거나 나쁜 법안들이 비판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동한(서울경제 3): 네,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립관계라고 할지라도 국익을 위해서 합의를 할 것은 분명히 합의를 해야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맹목적으로 상대방의 법안을 무시하는 것은 법안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좀 더 자신의 역할을 뚜렷하게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인데 지금의 의원들을 보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명예를 세우는 것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불법 로비를 근절하고 음성적인 로비들을 양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생산적인 활동은 분명하게 지원을 하되 그들의 특혜는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사명감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에 봉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의원의 역할을 위한 지원은 늘리되 사적인 행동이나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없애서 진정으로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손계준(서울지리 3):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입법과정의 문제에서부터 국회의원의 사명감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것을 막고 법안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 제도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기명 발의를 통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정당 간의 '타협과 양보'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향상된 법안의 질을 기대하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이효정(불어교육 12) : 안녕하세요? 어느 덧 마지막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들에서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국회의 입법 과잉' 문제입니다.

현재 19 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로 접수된 법률안의 숫자는 7,536 건에나 달합니다. 그 중 80%는 심지어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띄고 있어 보편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입법 과잉 사태가 우리 국회의 고질병인 원인은 우리나라 국회가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 가령 대통령 선거라든지, 지방 선거 때마다 큰 진통을 겪으며 특히 '폭력 사태'로 인해 입법 활동이 종종 저해를 받기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의회 정치를 선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유예송(영어교육 1) :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해 볼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치적인 일들과 국회의 의정활동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같은 일들과 전혀 상관없이 국회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선거 시즌만 되면 민생 법안보다는 정당 간에 대립을 하면서 본연의 의정 활동이 방해를 받곤 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아이젠하워 행정부부터 클린턴 정부 때까지 약 50 년 간을 보아도 대선이 있었을 때 의회의 평균 개정일 수는 299 일인데 반해서 대선이 없던 시기의 평균 개정일은 300 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의 활동은 마비되지 않도록 독립시켜 두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다솜(불어불문 2) : 저는 프랑스와 독일의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얘기해 보려고 해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모범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나라이죠.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라면 바로 입법영향평가제도예요.

우리나라와 같은 과잉입법의 문제를 막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죠.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입법과정에서 국민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결과를 비롯하여 모든 실효성과 부작용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벌써 10 년 전부터 도입한 이 시스템은 입법 절차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죠.

김민호(영어교육 2): 아, 과도한 입법과 불필요한 경쟁을 배제하여 보다 나은 법과 보다 적인 효율적인 규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군요. 우리나라도 그에 착안하여 규제영향분석, 법안비용추계, 부패영향평가 등 그와 관련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한계를 지니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정책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는 하나 특정한 분야에 한정된 평가제로 종합적인 체제를 지니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입법 과잉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강주은(아시아문명 1) : 발의안 검증을 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입법 과잉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저도 무척이나 동의해요. 입법 현황을 다른 국가와 비교 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원발의 법안이 가결되는 비율이 13.6 %로 독일의 25.1% 에 비하면 거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죠.

독일의 의원 발의안 수는 정부안의 비해 0.8 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와는 상반되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해관계들에 얽혀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요

강수림(러어러문 2) :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의원 발의안이 정부에 비해서 십 분의 일 정도예요. 이들 선진국은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역시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아직도 보다 근본적인 검열 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16 대 국회 이후로 의원 발의안과 가결안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법안들에 대한 철저한 검열과 효율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예요.

Kim yong (일본교환학생) : 일본 국회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영국 식의 의원내각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시스템적으로는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한국 만큼이나, 때로는 그 보다 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입법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는 국가의 국권 행사 최고 기관이며 행정부와 사법부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무엇보다 오랜 시간 지속 되었던 경제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률안들을 개정하는 데 가장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효정(불어교육 2) : 선택과 집중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경제 민주화'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었는데 과연 정말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너무 지나친 규제는 아니냐 하는 여론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리해 본 바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하나의 큰 공통점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의원 발의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예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만큼 의회 역시 변화에 대처 할 수 있고 또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신속함'과 '효율성'이 중요할 텐데 그를 위한 시스템이 어서 빨리 구축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②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은지, 김유진, 김보민, 김기동, 이동석, 이규상 (연대 정영2)

이동석(연세경영 2): 그럼 지금부터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입법과잉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선, 삼선의 욕심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 또 전체 국익이 아닌 지역구만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국회가 입법권한을 행정부에 양보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기동(연세경영 2):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입법권한을 행정부에 넘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국가권력을 나눠가지고 있는 삼권분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권분립에 체제 안에서 어느 한 부가 가지고 있던 고유권한을 다른 한 부에게 추가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행정부에게 입법권한을 넘기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입법부가 발의하는 법안과 행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절차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입법부가 발의하는 법안은 행정부의 법안과 달리 그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차를 좀 더 행정부의 법안 통과 과정처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에 대한 검사나 평가가 지금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경우 입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 경우에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좀 더 엄격한 다수결, 3 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다시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대통령의 법안거부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미국처럼 현실적으로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제도 또한 좀 더 활발히 사용한다면 굳이 입법권한을 행정부에게 넘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입법부는 행정부가 발의할 때처럼 절차나 평가 방식을 좀 더 세분화하고 미국의 예처럼 행정부가 법안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면 삼권분립이라는 큰 틀을 깨면서까지 입법권한을 넘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자료에서 나와있듯이 현재 법안 발의 건수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평가방식을 바꿔야 하며 국회의원 스스로로 전체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의식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상(연세경영 2):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의원들은 지역구를 챙겨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발의건수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발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동 학우는 행정부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이 삼권분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미 행정부도 새로운 법률안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있는 권한의 비중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이규상 학우께서 말한 김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입법권한을 모두 행정부가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권리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규상(연세경영 2):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법안 발의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렇게 많이 발의된 법안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 규제에 집중하고 있거나, 지역구만을 고려한다거나, 실제 현실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법안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행정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역시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경우 실제 현실 상황과 밀접하게 마주하고 있어 실제 필요한 법안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와 달리 전문성 역시 갖추고 있어 더더욱 법안의 질 역시 올라가고 무더기 법안 발의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성상 지역구에 대한 명령적 위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비교적 명령적 위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특정 국민들만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일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법권한을 행정부에게 좀 더 양보한다고 해서 입법부가 자신의 권한을 제한 받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 역시 억지로 해왔던 법안 발의를 멈춤으로써 다른 자신들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국익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행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는데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법안을 감시, 평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은지(연세경영 2): 저는 입법부가 무더기로, 그리고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 국민을 위한 자잘한 법안들을 대거 발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안을 제출하는 행정부의 권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입법부의 위상이 행정국가화 현상이 계속됨으로 인해 행정부에 비해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법부 스스로의 권리도 함께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행정부에게 더 많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되, 입법부에선 그것을 통과시킬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법안의 질도 올리고,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가능케 하면서 입법부의 위상 역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감시, 평가하는 '의원입법 시민평가 위원회'와 같은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같은 감시기구를 활용한 조정위원회와 같은 개념의 기구를 만드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그 법안은 먼저 조정위원회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통해 수정할 부분을 찾고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모아서 다시 입법부로 넘겨 통과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조정위원회 같은 단체가 서로 힘을 합해 법안을 발의하고 그 과정을 시민단체들이 감시한다면 무더기 법안도 방지되고 국민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법안들만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유진(연세경영 2): 저는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가 아닌 그 밑에 행정부 산하에 기관들을 행정부로 중심으로 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후자 쪽에서 발의한 법안들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의 경우 여당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발의한 법안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통과가 되는 반면, 그 밑 지방 산하 기관들이 꼭 필요해서 발의한 법안들은 거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통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쪽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좀 더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법안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들이야 말로 꼭 통과가 되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법안들이 지금 입법부, 행정부의 관계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거의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저는 행정부, 특히 지방 산하 기관들 중심의 행전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법권한의 비중을 더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민(연세경영 2): 저는 앞에 김기동 학우와 같이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행정부로 입법권한 비중을 넘기는 것에 반대합니다. 다들 모를 수 있는데 이미 법안을 만드는 법제처가 행정부 산하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더 강한 효력을 갖는 대통령 시행령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법규 500 개 정도 분석한 결과 절반 정도의 대통령령이 수정권고를 받았고 79 개의 규칙이 상위 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이미 행정부가 너무 비대화되어 있고 충분한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한까지 더 양보를 하게 되면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요즘, 시민 단체들 중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을 한 명씩 다 자세히 평가하여 공개하는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를 할 때 발의 숫자가 아닌 질로서 평가하고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더 잘 알리면 후에 다시 당선되기 위한 입법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관계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중요한 입법 시에 듣고 토론하는 것을 활성화한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무차별적으로 통과 되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 역시 입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례로 예전 황우석 박사 파문으로 인해 연구 윤리에 대한 법률이 매우 강화되었는데 그 때문에 이 후 연구 분야에서 제약을 많이 받아 연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입법이 우리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으므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여 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법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텔레비전에 지속해서 나오는 국회의 모습 등 때문에 불신이 쌓였기 때문인 것도 있으므로 국회도 앞으로 각성하고 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 입법권한을 행정부에게 양보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향후 입법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장서현, 박노원, 이어진, 송현지 (이상 이대교육2)

송현지(이대교육 2): 먼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미리 메일로 초청장과 토론문을 보내드렸듯이 지난 11 월 28 일, 국회의 입법 과잉에 대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의 '국회의 입법 과잉,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안만 쏟아낸다고 교육문제가 해결될까요?' 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통해 다른 분야도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 분야에서 만큼은, 과잉 입법, 졸속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르르 쏟아 낸 수십 개의 불필요한 법안들보다 학교 현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다양한 교육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오랜 기간 숙고한 뒤 만들어 낸 훌륭한 교육법 하나가, 훨씬 효과적으로 국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법을 통한 교육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책임질 미래의 인재를 키워낼 교육관련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입법은 그 어느 법안보다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시간 선택제 교사는 과연 교육 문제의 해결책이 될까?

가장 먼저 교육에 관해 공부하는 사범대 학생으로서, 제가 칼럼에서 교육과 관련된 과잉 입법의 한 예로 제시한 정규직 시간 선택제 교사의 입법예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서현(이대교육 2): 저는 정부가 진짜 학교 현장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교사 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간 선택제 교사는 절대로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일반 교사랑 시간교사와의 역할 충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담임도 못 맡기고 중요한 행정적 업무도 맡을 수 없을 테니 잔업만 맡을 수도 있어서 시간교사 교직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박노원(이대교육 2): 저는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또한 저 역시 시간제 교사들은 담임을 맡지 않게 되니까 정규 교사들의 업무량이 증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드네요.

장서현(이대교육 2): 간단히 생각해보면 하루 네 시간을 일하고 한달 90 만원 정도를 받는 교사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알바생 하나 고용하는 것과 다를 것 없다면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고급 인력을 낭비해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어진(이대교육 2): 그런데 원래 학교 교사들이 전부 담임을 맡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요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그렇게 시간제 교사가 담당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주요교과의 과대한 수업시수에 밀려 자신의 수업차수를 채우기 위해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상치교사도 생기는 현실이니까요.

박노원(이대교육 2): 글쎄요, 말 그대로 그냥 고용률 숫자 높이겠다고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진짜 교육현장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용률 70%라는 숫자 달성 때문에 먼저 공무원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려 하는 것이죠. 교사는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학생들과 늘 소통해야 하는 직업인데요.

이어진(이대교육 2): 근데 또 생각해보면 대학교 시간 강사는 하루 종일 한 대학교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강의평가를 받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들도 많은 걸 보면 잘만 도입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즉, 교사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고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교사를 배출해낼 수 있는 국가의 교원양성 시스템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겠죠.



송현지(이대교육 2): 저처럼 교육과 교사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시는 분도 있는 반면, 잘만 시행된다면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내주셨네요. 그렇다면 교육계의 입법 과잉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서현(이대교육 2): 요즘 인성교육이 교육계의 큰 화두인데,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국회가 인성교육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봉사활동을 정규교과목화하고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대학입시에도 인성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복합적인 측면에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법안을 토대로 해서 단순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나기만 한다면 이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담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이어진(이대교육 2): 네, 맞아요. 교육현실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나 의도는 좋지만, 진짜 효과적인 개선책이 나오려면 무조건 규정과 규제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법안에 녹일 수 있어야죠.

박노원(이대교육 2): 사실 교육을 위한 노력은 빠른 시일 내에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하는 정부에서는 큰 고민 없이 눈에 보이는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내놓고 이에 휘둘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지곤 하죠.

장서현(이대교육 2):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고부담 시험의 경우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겟이 되곤 해요. 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진지 올해로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우왕좌왕하며 큰 틀이 매번 바뀌곤 한다는 것이 참 씁쓸해요.

수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순간 순간의 흐름에 휩쓸려 툭툭 내놓은 법안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대입 시험의 형식이 계속해서 바뀌고 단 한 해 시행해보고 또 바뀌고 이런 모습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지(이대교육 2): 저는 얼마 전에 교직인적성검사를 봤어요. 지난해부터 사범대학교 졸업생들은 모두 이 시험을 치르고 통과해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검사에 대해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이예요.

교사가 될 인성과 적성을 객관식으로 된 문항으로 평가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 같은 2 학년 학생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교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그냥 치르고 통과할 수 있다면 교직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인성을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교직인적성검사도 최근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국가에서 최근의 사회 현상에 발맞추어 교직에 적합한 인성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뽑겠다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고안해 낸 제도일 텐데요. 이러한 필요성을 느낀 후 너무 단기간 내에 제도화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어진(이대교육 2):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교직인적성검사가 문제가 있으면 또 이것을 법안을 통해 없앤다거나 혹은 새로운 법안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 정말 법이 필요한지, 법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인지를 고민해본다면 꼭 그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박노원(이대교육 2): 제가 멘토링을 통해 수험생들을 상담해줄 때 자꾸만 바뀌는 입시정책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수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몇 과목 선택하고 몇 과목 반영하는지, 수시와 정시는 어떤 전형들이 있고 몇 개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지, 등등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진정한 자신의 실력만으로 평가 받아야 할 학생들까지 혼란스러운 교육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발 교육에 관한 정책만큼은 깊은 고민을 통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송현지(이대교육 2):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본 것처럼 현재 교육관련 입법 과잉으로 인해 교육계에 수많은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절대로 근시안적인 접근으로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육계에는 이러한 교육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입법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번 연구모임을 진행해보았는데요,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 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④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좌측부터 서영채, 공현덕, 박제진 (삼육 경영2)

김영재(삼육경영 2)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회의 입법과잉 문제와 최근 발의된 이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에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입법과잉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쏟아지는 법에 대한 '입법과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 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률안의 숫자는 총 7536 건으로 이를 제대로 심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법과잉의 해결을 위해선 법률안의 숫자 자체를 줄이는 것부터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법안 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의원을 평가하는 관행을 들 수 있습니다. 공천에서 법안 발의 건수를 반영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들도 발의 건수가 적은 것을 국회활동을 못한 것처럼 평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법안을 내고 보는 성향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의 입법 과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서영채(삼육경영 2) 19 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7546 건이나 되는 법률안들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많은 수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발의되는 법률안의 숫자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박제진(삼육경영 2) 네, 저도 그렇게 많은 양일 거라곤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양이라면 일일이 심의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법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공현덕(삼육경영 2) 네 그렇네요, 무엇보다 발의 건수가 평가의 기준 잣대가 되는 관행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법안 발의가 계속 된다면 그만큼 법의 질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불이익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박제진(삼육경영 2) 저는 좀 더 제대로 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된 모든 법안들을 심의하기엔 역부족이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위원회의 구성원을 늘린다거나 혹은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추가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좀 더 정확한 심의를 통한다면 이만큼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웬만큼 심의 위원들을 증가시키지 않고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공현덕(삼육경영 2) 저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의 원인이 심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법안 발의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후에 그 법안들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평가 기준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의 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만큼 불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진(삼육경영 2)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법안이 무조건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과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현덕(삼육경영 2)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불이익을 주는 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채(삼육경영 2) 제 생각엔 애초에 가이드북을 만든다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 자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 법안에 대한 기준이 내용인 가이드라인을 보고 자체적으로 검토 후에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준비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김영재(삼육경영 2) 발의 준비 과정에서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 모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도입된다면 제 생각일 뿐이지만 확실히 입법과잉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난 1 월 발의된 이후 여전히 논란에 둘려 쌓여 있는 게임중독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4 대 중독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내용의 법안인데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일명 게임중독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법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는데 게임중독법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박제진(삼육경영 2) 제 생각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양립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법안이 준비가 미흡한 법안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검토 한 후에 법안이 발의됐다면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공현덕(삼육경영 2)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게임의 중독성이 마약이나 알코올과 비교하여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고 게임 중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하지만 게임 자체를 마약과 같은 콘텐츠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단속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채(삼육경영 2)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입니다. 중독이란 단어를 달리 표현하면 몰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게임개발자들은 몰입도가 높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노력들이 이런 중독이란 단어 하나로 인해 범죄가 되어 버리고 게임 개발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측부터 서영채, 공현덕, 박제진 (삼육 경영2)

김영재(삼육경영 2) 네, 저도 게임 중독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게임의 중독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게임 그 자체를 중독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규제 대상들도 단순히 미성년자가 아닌 국민 전체를 대상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게임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 잠재력은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 인해 게임산업 발전의 저해를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중독법이 게임 중독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게임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는 법이 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임중독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회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서영채(삼육경영 2) 저는 게임 중독이란 문제가 애초에 가정에서 해결되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게임에 몰입하기 전에 가정에서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했다면 좋았겠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할만한 거라곤 게임밖에 없으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가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굳이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진(삼육경영 2) 저도 이 문제가 가정에서 해결되었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엔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게임을 개발한 게임업체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산업과 게임산업이 발달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른 개발자들과 게임회사들의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공현덕(삼육경영 2)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게임연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과 게임회사가 서로 협력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한다면 좋은 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네, 감사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게임중독법인데, 논란이 큰 만큼 준비가 부족했던 법안이었다는 생각이 들며, 이 법안이 국민들에게 이로운 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각고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연구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입법과잉과 게임중독법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한 학기동안 함께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저만의 생각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의 생각을 함께 공유했던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연구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⑤ 인천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민수 (인천 중어3), 장지구 (인천 산경4), 조지혼 (인천 정외4), 황선우 (인천 영어3), 김영진 (인천 경영1), 김우갑 (인천 정외3) - 시계 방향 순

김우갑 (인천 정외 3): 늦은 시간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퓰리즘 입법에 대해서 토의하고자 합니다.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하면 인기 영합주의 입법, 한 마디로 표를 얻기 위한 입법을 뜻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을 보면 특정 이해 관계세력을 위한 법률안, 여론의 대세를 따라 발의된 법률안 등 표를 얻기 위한 법률안이 대부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표가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 자신에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정 이해 관계만을 반영하다 보니 공익이 침해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큰 문제는 표를 의식하다 보니 그것이 올바른 법안인지, 입법 취지에 맞는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만들어진 법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법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인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들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여론의 대세가 되자 입법부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편법 대물림을 막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를 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편법 대물림을 막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과세 대상자의 98.5%가 중견·중소기업인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 규제 성격이 강한 법이 여기저기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대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협력 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포퓰리즘 입법을 완화시켜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러분들과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알아보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나 주변에서 이루어진 포퓰리즘 입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제 주변 사례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무상 급식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급식을 시행할 경우 안 그래도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에 더 큰 부담이 되겠죠.

영남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도 또 다른 포퓰리즘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영남 사람들은 땅값도 많이 오르는 등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건설하는데 국가적으로 많은 돈이 쓰이기 때문에 영남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 또는 입법이 일부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입법이 완전히 사라지기 힘들지만 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지구 (인천 산경 4): 저는 저희 동네의 경전철이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경전철을 건설하기 전 사전 수요 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용할 거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요. 실제로는 이용객이 예상 이용률의 10 분의 1 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입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타당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들이 형사 고발을 당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실과 격차가 많이 나고, 효과도 못보고, 그리고 혈세만 낭비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가지 더 얘기하자면 화평법이라고 하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건데요. 특정 업체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어서 인명 사고도 나고, 자연도 훼손 시켜서 화학물을 관리하는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최근에 국회가 들끓었었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도 지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게 타당한 정책인지는 검토가 많이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출액의 50% 이상이 넘는 과징금을 책정해서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하나의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입법은 재고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한 가지 보태자면 포퓰리즘 입법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 사례가 퍼주기 입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등록금 공짜로 해주겠다. 노인 복지 공짜로 해주겠다. 등 퍼주기 식 입법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수많은 법들을 현실화 한다면 수혜자들에게는 좋겠지만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덜나겠죠. 그렇다면 그런 입법들을 막아야 할 텐데. 의원들이 표만 의식해서 그런지 그런 입법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입법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산을 끌어 올지에 대해서 말하는 의원들이 드물어요. 예산의 출처, 예산으로 어떤 효과를 달성할지에 대한 확실한 정책 평가서를 입법 과정 중에 제시함으로써 전문가들에게 평가받도록 해야 경각심을 갖고 입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진 (인천 경영 1): 포퓰리즘 입법이 나쁘다고 하는데 입법이 되게 된 이유가 단순히 인기를 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라면 그대로 실현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인데, 입법 과정에서 항상 전문가들의 타당성 평가를 하게 하고, 예산 평가를 한다면 좋은 입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그런데 지금 법안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입법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을 보면 먼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라는 곳에서 법률안에 대해 의원들이 심의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회의로 넘어가서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18 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교육 관련 법률안이라고 하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 법률안에 대해서 사전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안의 사전 심사 및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김우갑 학우의 말이 사실입니다.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국방위원회의 경우 국방 전문가인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원 전문성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보좌진의 전문성 문제라고 봐요. 실제로 보면 의원이 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 보좌진들이 입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좌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보좌진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법과 상충되지는 않나 알아야 하는 등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여야 하는데요. 물론 신의진 의원 같은 경우 정신 의학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게임 중독 방지 법안 만든다고 하니까 온갖 비난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좌진의 전문성이 중요한데. 보좌진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의 보좌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전혀 없죠. 뽑아서 선배한테 도제식으로 배우는 게 다고, 전문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바꾸게 하는 이런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전문성이 커지는 것이지 계속 옮기면 전문성은 생기지 않겠죠.

김우갑 (인천 정외 3):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법을 담당하게 되는 보좌진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인천 중어 3): 저는 지역구 사람들만을 위한 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사람들을 위한 입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는 입법을 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 해주신 대로 전문가들의 입법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는 전문가들이 지역민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민으로 이루어져서 평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통해 한 지역에 편향된 입법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입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TV 조선의 보도를 봤는데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법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지훈 (인천 정외 4): 다시 발의하는 이유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폐기가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시 발의하는 것인데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계속 제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황선우 (인천 영어 3): 저는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돌아가서 싱크 탱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현재 싱크 탱크들이 많지만 입법에 반영될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법부가 이 싱크 탱크들의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도 많이 해서 전문성을 높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안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법부 혹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인천 중어 3):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 몇 개 만들었다, 우리 지역구를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효과와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지구 (인천 산경 4): 저도 국회의원에 대해 중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김우갑 (인천 정외 3): 지금도 시행되고 있기는 한데 시민 단체에서 주로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시민 단체가 평가한다고 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찾아보죠.

조지훈 (인천 정외 4): 그런데 중간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압박하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회의원이 대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국회의원이 얄미울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평가에서 그 국회의원을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 때 재선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중간 평가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김민수 (인천 중어 3): 그래도 중간 평가에 공익성이 많은 법을 얼마나 많이 발의했나, 법이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 요소가 추가된다면 중간 평가가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조지훈 (인천 정외 4):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선거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런데 당에 속한 의원은 공천을 받아야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천 심사 시에 김민수 학우가 말한 평가 요소들을 집어 넣는다면 중간 평가 없이도 의원들이 일을 잘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영진 (인천 경영 1): 그런데 저는 평가 요소에 공익성이 많은 법을 얼마나 많이 발의했나, 법이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것이 추가되면 국회의원들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법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단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법안만 만들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법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중, 장기적인 효과를 내다보고 법안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주제와 관련된 월례토론회에서 토론을 해주신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는 규제 영향 평가 법안처럼 국회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법안을 발의하시는 등 소신 있는 입법을 하십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단기적인 효과만 바라보고 입법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저는 국민들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의식 향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명하다면 현명한 국회의원을 뽑겠죠.

그래서 국민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어릴 때 민주주의나 헌법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투표율도 낮고, 주권 의식도 낮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따라서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나 헌법에 대해 가르친다면 국민 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고, 현명한 유권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포퓰리즘을 막으려면 메니페스토 운동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국민과 국회의원이 함께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선진화 연구모임이었는데요. 거듭되는 부탁에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는 말씀 드리며 인천대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⑥ 상명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오른쪽부터 김재혁(상명국통3), 허유민(한양컴공2), 한승규(상명일교3)

김재혁(상명국통 3) : 안녕하세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학우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크게 국회의 입법과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저는 여러분들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선때부터 시작해서 최근 남양유업 사태까지,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약자인 을을 보호하고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일부 진영에선 아직 이러한 노력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른 일각에선 이러한 각종 법안들 대부분이 규제 위주의 법안들이어서 우리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경색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현재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과잉입법으로 보시는지 과소입법으로 보시는지 그 생각을 들어보고 정도의 수준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허유민(한양컴공 2) : 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계속 부르짖다보니 저 역시도 경제민주화는 당연히 우리사회에서 이뤄내야 할 이상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상생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되었다

김재혁 학우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보니, 이것이 잘못 규제되면 기존의 잘나가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제반 산업과 경제 성장 및 기반이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현재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이 너무 과잉입법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특히, 이러한 법안들 대부분이 규제위주의 법안들이라는 사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승규(상명일교 3) : 네, 저는 허유민 학우분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현재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얼마나 많이 발의되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어떠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얼마나 많이 발의되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너무나 경쟁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나가는 대기업들 위주로 모든 경제의 포커스를 맞춰왔었죠.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진흥시키지 못하고 지원도 미비해왔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계속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경제기반의 모순과 약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시대적 사회적 수준이 변화하고 요구도 변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바로 잡을 시기가 되었단 말이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꼭 필요하며, 그 수준은 현재 제가 생각하기론 아직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다양한 입법안, 우리사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허유민(한양컴공 2) :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주로 규제위주의 법안들이고 특히 대기업들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론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중소기업이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법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쪽을 국회의원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입법을 발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기업을 너무 풀어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기업의 횡포와 방만한 경영 등은 지탄받아야 하고 규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기술의 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사람인데, 피땀흘려 만든 중소기업의 기술 등을 대기업이 부당하게 탈취하거나 이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습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당근과 채찍을 대·중소기업간 적절히 사용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재혁(상명국통 3) : 네, 두 학우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 서로 생각이 상반되는군요. 자, 그럼 이제는 좀 더 큰 틀에서 살펴보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든 어떤 법안이든간에 우리나라의 경우 법안들을 주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입법 발의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앞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의 과잉,과소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본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무분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안, 과연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까요?

한승규(상명일교 3) : 저는 이와 관련해서 먼저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계몽과 개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법안들을 무분별하게 발의함으로써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그들 스스로가 먼저 자각해야겠죠.

그다음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겠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일종의 어떤 경종을 알릴 순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미국의 컨슈머리포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보고 그에 대한 생각과 의견 등을 개진하는 커뮤니티인데, 이와 비슷한 레지슬레이션리포트, 뭐 이런 식의 커뮤니티나 단체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입법을 평가하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컨슈머리포트와 같은 레지슬레이션리포트가 생긴다면 어떨까?

즉,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입법 발의된 법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국회차원과 시민단체차원에서의 방안이 모색되야 할 것입니다.

허유민(한양컴공 2) : 저는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의정 평가 활동에서 얼마나 많은 입법안들을 발의하느냐가 평가항목에 들어가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가 생기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의정 평가 활동에서 일정수준 한정된 발의 법안만을 평가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김재혁(상명국통 3)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학우분과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과잉입법이냐 과소입법이냐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입법 발의현실에 대해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모임으로서, 이제 저희들의 연구모임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각자 선진화 연구모임을 하면서 느낀 소감 등을 짧게 말씀해주시겠어요?

한승규(상명일교 3) : 선진화 연구모임이라고 하길래 처음엔 너무 거창해서 하기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연구모임을 통해 사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많이 증대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유민(한양컴공 2) : 저는 이과생이라 사회, 정치, 경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선진화 연구모임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얘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알지 못했던 부분을 연구모임을 통해 알게되고, 얻은 것도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을 통해 쉽게 보지 못할 친구들의 얼굴도 함께 보니 일석이조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모임을 통해 선진한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았다

김재혁(상명국통 3) : 네, 말씀 감사합니다. 4 개월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연구모임을 통해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주신 학우님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더 많이 고민해주시고 관심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⑦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권미소(과기경영3), 김재희(과기영어3), 이정빈(과기행정3), 장슬효(과기 안광3)

김재희(과기 영어 3): 지금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차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입법과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입법은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역시 실제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지는 못해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사해보니 입법과잉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아동청소년법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적발건수가 늘어났지만 상당수가 실수로 파일을 다운받다가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입법으로 일반인이 범죄자로 몰릴 뿐 아니라 경찰들이 사소한 업무에만 치중해 아동들을 실제 성범죄에서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입법과잉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여러분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을 하기 전 시민들이 이를 평가하고 스크리닝하는 과정인데요.

이 입법평가시민위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 입법평가시민위원회, 여러분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정빈(과기행정 3): 저는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효과가 나온다는 보장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의 노력이 실제 입법에 반영돼야 합니다. 단순히 참여만해서 예, 아니오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또, 이를 위한 시민들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과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그 사안이 그 시민들과 많이 가까이 있는 사안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참여했는데 그 사안이 저에게서 먼 사안이라면 이는 왜곡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민들은 여러 사안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입법이 직업이 아닌 사람이기에 이 경우 왜곡이나 편향된 지식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입법과잉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장순호(과기안광 3): 저는 참여하겠습니다. 입법과정에 연관될 기회가 많지 않는데 이 기회 자체가 영광입니다. 투표만으로 제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 속에서 직접적으로 법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편법은 없는지 알 수 있어 정치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저에게 큰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제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전문가가 한 두 명씩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뿐 아니라 잡아주는 멘토, 중심잡이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권미소(과기경영 3):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이나 사안에 있어서 그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안들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무지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민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바쁘니까 대표를 뽑는 건데 다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취지가 훼손되고 많이 벗어나고 그 과정을 참여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입법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무지한 시민들이 사전교육을 한다고 해서 법안에 대해 본질적으로 깊게 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불어 대학생의 신분으로 가서 그 사안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올지도 의문입니다. 저완 동떨어진 내용이 많고 도움이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빈(과기행정 3):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관할지역에만 입법을 해서 문제입니다. 이들은 큰 안목을 가지고 입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사례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제해 줄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김재희(과기영어 3): 입법에 대해 본인들이 얼마나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참여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시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이 나와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참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또, 이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시민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정빈(과기행정 3): 의원들의 대표성이 약화될 것이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입법과정에 그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이 높아진다면 이들의 대표성은 약화될 것입니다.

이 제도로 민주적으로는 더 발전하고 민주성에는 더 기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표를 뽑는 자체에 대한 회의가 올 수 있고 그들의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거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선출에 대해 국민들이나 대표들의 회의감은 커질 것입니다.

권미소(과기경영 3): 또, 법안의 수로 의원을 평가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양적인 내용이 아니라 법안의 질적인 평가가 의원들의 성과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성과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빈(과기행정 3): 사실 입법이 사전적이라기보단 사후적인 활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제가 많은데 그러려면 정확한 분석과 이를 위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전문가를 요합니다. 이에 반해 시민들을 이를 위한 시간이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장순호(과기안광 3): 사실, 무분별하게 입법이 난무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시민이 입법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단계이기도 합니다. 입법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실용적 평가단으로서의 시민들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정빈(과기행정 3): 이 제도에 또 다른 문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시민위원회가 잘 발현 될 텐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협의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필요했던 거기도 하구요.

장순호(과기안광 3): 사실 공짜로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 증진을 위해서 현재 경기도 안 좋으니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정량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한편, 재정상 어렵다면 대학생의 경우는 수료증이나 단증 발급도 또 다른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스펙을 쌓고 있는데 이러한 참여의 증서는 그들에게는 스펙이 되고 이 시민위원회에게는 좋은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이정빈(과기행정 3): 구성원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구성할 것인가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관심 있는 학생만 늘 참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맨날 같은 얘기만 나오겠죠. 그럼 그 취지가 또 퇴색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민위원회의 활동들은 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고 싶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한 사람들의 의견은 결국 반영되지 않겠죠. 따라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모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희(과기영어 3): 의원의 대표성 문제, 시민의 전문성 및 시간의 부족, 입법의 존엄함 훼손가능, 인센티브 필요, 다양한 시민참여에 대한 의문이 문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빈(과기행정 3): 인센티브는 앞서 말씀하신 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주어도 좋겠죠. 하지만 금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돈을 대가로 주는 것은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해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유인책을 쓰게되면 물질만능주의 의식이 팽배해질 것이고 이는 선진시민의식이 아닙니다. 돈을 줘야 참여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 시민위원회의 본래 취지가 변질될 수도 있구요.

따라서 이를 증명하는 증서나 사회참여를 잘 했다는 의미에서의 상 혹은 취업가산점이 더 나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사회적인 장려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물질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사회문제에 참여하게 하는 장려책이 말입니다.

권미소(과기경영 3): 더불어 금전적 혜택은 정부의 예산에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문제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에게 어떠한 지출내역을 만들어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법평가를 위해 양질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순호(과기안광 3): 시민위원회의 지적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제공할 양질의 교육인이 필요하겠죠. 그들은 양질의 법률 전문가 일텐데요. 그들을 어떻게 데려올 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 쪽에서는 금전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재희(과기영어 3): 이는 결국 앞서 권미소 학생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부 예산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빈(과기행정 3):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참여문제와는 다릅니다. 시민 인센티브는 한 명 한 명한테 주는 것이라서 금전적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시민 100 명을 위한 한 명의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덜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이는 꼭 필요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교육이라 그 파급효과는 단순히 시민위원회와 입법평가를 넘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입법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범국민적 참여를 하게 되어 시민들이 좀더 친숙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표성약화 문제는 입법 완료된 시점에서 그 입법 내용의 질을 따지는 평가단으로서 시민을 투입하면 국회의원에 대표성도 약화되지 않고 입법에 대한 검열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권미소(과기경영 3): 저 역시 그 아이디어에 동의합니다. 그 활동이 장기적으로 나왔을 때는 입법이 성과결과를 반영하여 입법과정에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활동의 상호작용이 돼서 환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순호(과기안광 3): 또 시간의 문제는 사실 정치적 무관심 문제입니다. 홍보가 아무리 된다고 해도 무관심하면 소용이 없죠. 또 이런 무관심은 불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인들의 발언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를 통해 실망하며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제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에 대한 믿음이나 동기부여 요소를 충분히 제공하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참여할 것입니다.

특히나 기업의 경우, 입법에 대해 대체로 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자 하죠. 기업입장에서는 입법이 많아질수록 위축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업 차원에서도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참여할 수 있게 장려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정빈(과기행정 3): 아닙니다. 사실 기업을 풀어주는 법도 많습니다. 그것이 정경유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대상보다는 도움이 되나 우려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배심원제도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배심원제도를 돌아보면 어떤 유인책으로 그들이 사법과정에 참여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여기에 적용시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권미소(과기경영 3): 다양한 구성원에 대해 노령화로 접어들며 인구구성비는 이미 깨졌습니다. 따라서 다양성 문제에 관해서는 인구 구성비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현안에 관련된 자를 구하는게 중요한데 이는 가치 개입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책과정에 대해서는 사익이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입법과정도 완전히 중립적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위해 나이와 직업에 따라 수를 제한하고 그에 맞춰 위원을 선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재희(과기영어 3): 지금까지 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법 사전 검열이 아닌 입법 후 질평가에 반영하자는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시민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법률전문가를 통한 교육, 시민들의 시간부족과 관련해서는 참여에 대한 믿음 확보 및 기업의 협조, 인센티브는 증명서 차원, 다양성에서는 직업별, 나이별 인원 제한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위원회가 보다 값지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겠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법은 국민들에게 독이 됩니다. 이를 적절하게 검열하여 법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⑧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좌측부터 전슬기(숙명홍광3), 홍다영(숙명컴과2), 김혜인(숙명홍광3)

김혜인(숙명홍광 3): 먼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연구모임의 주제는 국회의 입법 과잉, 그 중에서도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게임 규제 법안에 관련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내용은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과 더불어 게임을 4 대 중독 유발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자는 것인데요.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법안인지라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게임 중독자 구제를 내세우며 우리 나라가 게임 산업 강국인 만큼 중독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게임 산업 자체가 휘청일 수 있으며,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등과 함께 묶어 규제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주창하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 및 앞으로 게임 규제 법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다영(숙명컴과 2): 혹시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라는 일본 영화를 아시나요? 한 남자가 치한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에 대한 재판을 벌이는 것이 이 영화의 골자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형사들은 이미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지은 후 그 프레임에 맞춰 수사를 진행합니다.



영화 속에서 경찰은 이미 주인공의 범행을 확신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주인공의 집을 뒤지고 나서, '집에서 음란물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변태적인 성향이 있었다' 라고 단정짓는 식입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후 그에 대한 증거를 찾아 끼워 맞추는 셈이지요.

이처럼 게임중독법도 어쩌면 게임을 이미 '중독을 야기하는 물질' 이라고 낙인찍은 후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게임 자체는 영화나 도서와 같은 문화 컨텐츠의 하나입니다. 게임 중독을 야기하는 진짜 원인은 입시 스트레스를 풀 별다른 방안이 없는 환경 등 사회 전반의 문제인데, 그 원인을 규명할 생각은 않고 게임만 규제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전슬기(숙명홍광 3): 저도 동감합니다. 게임 중독은 여러 결과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게임을 못 하게 하면 모바일 게임을 하면 그만이고, 게임이 안 된다면 다른 일탈거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야기한 "원인" 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아이들에게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를 주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문화 복지 정책을 펼친다면 게임 중독 문제는 자연히 사그라들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태연(숙명홍광 3): 저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게임 산업이 지나치게 사행성을 띠고 있고, 자극적인 컨텐츠들로 과몰입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PC 방을 한 번 돌아보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게임에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요소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게임의 주 이용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나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시스템과 선정적인 컨텐츠들은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게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자체를 부정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듯 한데요.

이렇게 게임을 애초에 '중독물질' 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게임행위 자체를 막는 것이므로 게임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심의나 사행성 방지 등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진행되어야지, 행위 자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인(숙명홍광 3): 좋은 지적입니다. 게임 산업이 문화컨텐츠 수출에서 60%가량을 차지하는 달러박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업 자체를 '사회악'으로 치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적절치 못한 듯 합니다.

과거 한국보다 더 심한 게임 규제를 했던 중국 정부는 경제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 장려책으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게임 과몰입 해소 방안을 고안하는 연구소를 따로 설치해 운영하는 동시에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우리도 게임의 부작용 규제와 더불어 문화 산업으로써의 지원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게임 규제보다는 게임 중독을 불러일으킨 원인을 바로잡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행위 자체를 막기보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게임 규제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방태연(숙명홍광 3): 저는 게임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봅니다. 게임 업계들이 자성을 통해 불건전한 컨텐츠들과 지나친 현금 결제 유도를 자제한다면 자연히 규제의 필요성도 사라지고, 국민들도 "왜 굳이 규제가 필요하느냐"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홍다영(숙명컴과 2): 저는 그것과는 약간 다른 관점입니다. 초콜릿이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초콜릿을 먹는 행위 자체를 국가가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중독된 사람들의 치료를 돕는다는 형태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선택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은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율 규제든 국가의 규제든, 규제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게임 산업도 문화 컨텐츠의 하나라는 인식을 정책 담당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중독 문제 역시 게임이 하나의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해결이 빠르지 않을까요?



김혜인(숙명홍광 3):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홍다영 학우께서 '게임 중독 문제에 게임이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해결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홍다영(숙명컴과 2): 마약이나 담배 등의 물질 중독은 그 자체를 멀리하도록 해야 하지만 게임과 같은 문화 컨텐츠의 경우 중독된 원인을 제거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약과 담배의 경우 그 자체에 실질적인 중독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문화 컨텐츠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별달리 없거나, 현실도피를 하기 위해서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시작하여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문화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면 중독 문제 해결도 빠르지 않을까요?

전슬기(숙명홍광 3): 동의합니다. 게임 중독의 절대다수층인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 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교육이 바르게 된 학생이라면 게임에 나쁜 영향을 받거나 과몰입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혜인(숙명홍광 3):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와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규제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앞으로 법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대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게임 규제 법안에 대한 숙명여대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⑨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백주아, 이필환, 인현식, 이인환, 신희영

백주아: 국회의 입법 과잉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입법이란 두 가치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실질적 입법 즉 행정부나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입법과 둘째는 형식적 입법으로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할 입법은 바로 형식적 입법입니다.

의원발의 입법의 문제는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마땅한 심사가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발의 입법에 비해 다듬어지지 않고 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쓸 데 없는 내용, 불필요한 내용, 실행가능성 없는 내용 등 성급하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학 수업을 기존에 들어본 경험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 입법 과잉 문제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 예를 들어 가장 이슈화가 크게 된 것이 '게임중독법'과 같은 이슈요. 이런 게 바로 의원입법입니다. 기존에 과잉 입법에 관한 이슈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신희영: 저는 정치외교학과이다 보니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한 번 언급하시고 넘어간 적이 있어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과잉입법의 문제는 포퓰리즘에 근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발의한 입법 건수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보여 주기식, 인기 영합식으로 제정되고 있다는 수준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필환: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연구 모임을 준비하면서 처음 듣게 된 내용입니다. 게임중독법 자체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내용만 접했지 게임중독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는 사실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현식: 아예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미리 보내주신 자료를 읽어보아도 개념들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꽤 애를 먹었습니다.

이인환: 저 같은 경우는 희영씨와 비슷한 수준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에 관여할 때 법의 효력이나 중요성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표심을 사기 위한 입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규제영향평가가 결여된 의원입법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백주아: 네, 저도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처음 접하곤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삼권분립의 나라. 입법 사법 행정권이 독립되어 있는 나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왜 우리는 국회 입법에 대해 기존에 들어본 경험도 적고 국회에서 발의하는 입법들을 전혀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최근 이슈화된 몇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입법안들 때문에 이 문제에 친해지게 되었지 우리 대부분이 국회 의원 입법이 어떠한 수준,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견된다고 봅니다. 의원입법의 문제가 이슈화되는 건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입법안이 제출이 되고 그 내용 또한 충분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 논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하던 중 제가 잡은 각론은 경제부분에서 특별히 기업규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치 아래 무분별하게 발의되는 입법들이 상당히 많아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기사를 최근 많이 접했는데요. 먼저 묻고 싶습니다. 경제민주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목표가 잘 달성되어가고 있다고 느낍니까?

이인환: 경제민주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결국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도와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제가 느끼기엔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듭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파악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에 던져져 있던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이전에 없던 규제와 정책들이 쏟아지기만 할뿐 실제적으로 그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요.

이필환: 저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는 그저 말뿐인 구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선거 때 외치는 구호가 그 정권의 모토가 되지만 당선 후에는 그 외침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정권을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명목상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어디도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인현식: 민주화라는 개념 정의부터가 잘 정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맡기는 것 역시 민주화의 개념이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도 민주화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고 느껴집니다.

성희영: 현재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진행되는 것들로 딱 생각나는 건 기업 때려잡기, 재벌 벌주기 정도입니다. 함께 상생하자고 내건 기치인 것 같은데 연일 신문을 장식하는 내용들이 기업을 옥죄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보여 주기식 모델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포퓰리즘적 냄세가 강한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백주아: 다들 경제민주화에 대해 꽤 부정적인 입장들을 견지하고 계시네요. 공통점을 뽑아내자면 포퓰리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의원발의 입법안 중에는 기업규제 항목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제가 사전에 공지했던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기업규제 항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인현식: 주아가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게임중독법 역시 한편으로는 기업규제 법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중독법이 청소년들을 위한 법이라고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을지 몰라도 사실 내부를 파고 들어가면 게임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켜 게임회사로부터 잇속을 챙기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의원입법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정치권에서 입법권한을 강권적으로 행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손에 쥐어진 권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자신 발 아래 두겠다는 심산이라고 보여진다고 할까요? 일단 발의만 해도 이슈가 되니까 주가 변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신희영: 제가 알고 있는 기업규제 입법은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해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이요. 경제 민주화의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의 자율성에 위배가 되고 과도하게 표심을 공략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주아: 네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기업규제관련 입법에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하여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가격을 차별적으로 제시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이 법안 또한 강력한 기업 규제 법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필환: 보조금을 동일하게 책정할 경우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는데 반해 기업이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규제 입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주아: 네 맞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당장에 동등한 수준에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일단 평등한 조치니까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이건 오히려 불평등한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기존 시스템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한 기업 규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출처:YouTube)

이인환: 수업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단말기 가격을 공개하는 것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단말기 가격을 공개했을 경우 예를 들어 삼성과 애플이 경쟁을 할 때 삼성에게는 상당한 피해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백주아: 네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인환: 제가 알고 있는 기업규제 관련 입법에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법률안이 있는데요. 대형마트 규제라고 이야기하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정하도록 명시해놓은 규정인데 이 또한 기업에겐 역차별적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주아: 기업 규제와 관련한 입법들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꽤 친숙한 내용의 법안들인 것 같습니다. 기업 규제. 물론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시장실패라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경우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죠.

위법과 편법을 쓰는 기업이 있다면 단연 정부가 나서서 이를 저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막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라면요, 기존의 구조를 굳이 헤쳐가면서 특정 계층과 특정 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오히려 다른 차원의 기업들에겐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얘기해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대형마트 규제 말씀해주셨는데 재래시장 살리자고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하면, 과연 죽어가는 재래시장이 살아날까요? 한 쪽을 규제한다고 한 쪽이 사는 게 어떻게 상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정부에 개입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다른 쪽을 살릴 다른 방안을 강구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게 소탐대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필환: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네 빵집 살리겠다고 빠리바게트와 뚜레쥬르가 못 들어오게 막아놨더니 오히려 그 자리에 외국계기업이 소유한 빵집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언가 모순이죠. 동네 빵집은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인현식: 정부 규제문제는 독점기업에 대해서야 의미가 있지만 독점기업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적당히 가하는 것은 시장실패에서 독과점 기업의 횡행을 떠올려 보았을 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만 한편으로는 상생이라는 좋은 말이 함께 다같이 성장하자는 건데 동네 빵집을 보호하는 것도 아예 의미가 없는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에는 미용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무도 미용실 옆에 미용실이 들어선다고 그 미용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빵집과 미용실의 차이는 출발선이 어디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미용실은 미용실끼리 완전 경쟁시장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동네 빵집과 대기업 빵집은 출발선이 다르니까요.

상생할 수 있다면 좋지만 아까 재래시장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발선이 다르긴 해도 정부가 할 일은 앞에 가는 대기업을 뒤쳐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간극을 조정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줘서 그 간극을 메우는 방식으로요. 규제가 아니라 지원하는 차원이 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환: 빵집이든 커피집이든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이 좋은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또는 동네 빵집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재래시장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기업의 전적인 횡포는 아닙니다.

통일 시장 같은 경우가 그 예인데요, 돈을 엽전으로 바꿔서 그 엽전을 이용해 재래 시장 안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죠.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방식 또한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현식: 저희 동네 시장도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상품권을 주는데요 그 상품권은 그 시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 구역도 번호로 잘 구분해 놓아서 사람들이 오기 쉽게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재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희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규제를 심하게 한다고 다른 측면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저희 동네 시장 같은 경우는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재래 시장이 불편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 역시 상품권을 통해서 전부 통용이 되고 상품권을 제시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알려줘서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너무 심한 규제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밀어내기 관행 법이 강해졌는데요.

기업을 조이면 기업은 그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유통 구조를 바꾸어 밑에 있는 대리점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를 규제해서 하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백주아: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글로벌 경제 전쟁 속에서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 완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죽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완전 반대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에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표심을 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세계적인 흐름도 무시한 채 역행하는 꼴인 것이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현식: 삼성과 애플 언급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을 것 같네요. 글로벌한 기업들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가 어떻게든 우리나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백주아: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해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특정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사정을 봐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인환: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과잉입법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던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자꾸 생겨나다 보니 이를 처리할 당장의 미봉책 식의 법안을 발의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세워진 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될 텐데 법도 변화하는 환경과 함께 변해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충분한 심사가 없이 진행되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현식: 법 제정 시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선 법안 내용을 구성할 때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각 분야 별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자문가와 같은 사람들이 붙어서 입법 제정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백주아: 네. 자연스럽게 규제영향평가제도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 입법 과정에 있어서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 과잉입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의원입법의 절차는 정부 법안 절차에 비해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고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인현식: 저도 단계를 확인해 보았는데 정말 쉽게 쉽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다양한 전문가집단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자기네들끼리 해먹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들어갈 구멍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인환: 국회 입법안이 약간 학위논문이랑 비슷한 형식인 것 같아요. 단행본 하나를 만들 때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자나요. 물론 저널에 실리는 학술 논문은 통과가 어렵지만 학위논문은 쉽지 않습니까? 성격이 비슷해요. 여기 저기서 가져다 붙이는 거며. 대강 대강 짜집기 하는 거며.

백주아: 의원발의 입법안이 쉽게 통과되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 개선안 역시 이 차원에서 통과되었어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에 맡긴 것은 규제위원회의 평가를 피해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정부발의 입법은 규제위원회를 걸쳐 까다롭게 심사가 되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이한구의원이 제안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규제 영향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필환: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기된 의원입법의 문제가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었죠.

이인환: 필요성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바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의 논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누가 평가를 하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논의가 되어야 하는지 등 기준마련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더 신중해야 하고요.

인현식: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는 어떠한가요?

백주아: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있다면 절차가 까다롭고 법안 자체를 분석하는 전담위원회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환 오빠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규제영향평가제도를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대학생으로서 의원입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현식: 지속적이고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해 전혀 몰랐음에도 오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해 알게 된 것처럼 다른 때도 한 번쯤 이 주제를 접하게 되면 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론장을 스스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희영: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것처럼 의원들이 입법안 발의할 때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해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환: 제가 광고를 전공하다 보니 www.tbcf.com 사이트가 생각나는데요 모든 광고가 저 곳에 집결되어 있는데요, 입법 또한 마찬가지로 입법에 관한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와 중립적인 운영자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의한 법안에 대한 책임성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백주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니 누구에게든 공평해야 합니다.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시정행위가 요구됩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12시 방향 본인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승모,
최윤진, 이동건, 전희은, 전형진, 이경필, 정재은

이승주(경영 4):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저의 칼럼 주제와 관련된 많은 지식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얻어 재선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되는 현실이 제도적으로 잘 감시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 차례대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들이 정치, 경제 등 시사에 관심이 많아져서 집단지성을 높이는 방안을 규제의 한 종류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 계신 여러 지식들을 동원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윤진(경영 2): 시사에 관심이 많아지면 투표율이 올라가서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이 더 엄격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적 이익만 추구하던 국회의원들은 재선하기가 더 어려워지니 규제로서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대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선동 당하여 정확한 fact 가 아닌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상태로 투표가 이루어지면 결국 결과는 같아지기 때문에 시사 상식과 교양 수준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검증된 뉴스와 미디어 채널이 이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승모(신방 4): 보통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세력들은 순수한 지역구민이라기보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특정 집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집단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해가 되는 일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보언론들은 기사 이슈를 위해서 이들을 정당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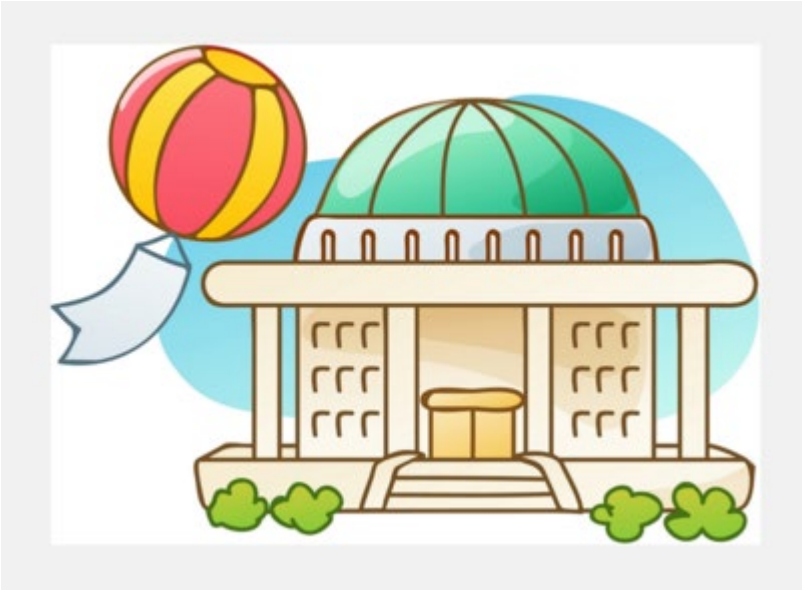
따라서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규제로서 유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사들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경필(경영 2): 저도 앞에 분들 의견에 동의하고 집단지성이 과잉 입법 규제로써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이 강화되기 위해서 어떤 매체들이 활용되어야 할지 생각해봤는데, 토론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치, 경제 시사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단들은 인터넷, 신문, 뉴스 등 이미 포화상태라고 할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잉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것을 보면 집단지성 강화를 위해서는 source 를 다양화하기보다 어떻게 기존의 것들을 활용할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봐요.

토론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이 시사에 대한 공부를 더 하기 때문에 토론은 기존 시사 제공의 매체 활용 빈도를 늘릴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전형진(경영 2): 100 분 토론을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선입견을 갖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런 점에서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각도로 사회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내는 공약들이 선심성 포퓰리즘인지 진정으로 효과성이 고려된 훌륭한 공약인지 판별할 수 있으니까 집단지성 강화가 되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전희은(경영 2): 그런데 토론을 통해 형성된 집단지성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속임수나 이해타산적 행동을 바라보는 눈이 더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가정이 실제로 정확하려면 토론을 통해 집단지성이 형성된다는 연결고리가 이어져야 하는데 만약 이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먼저 토론이 단순히 대다수 국민들이 100 분 토론 같은 시사프로그램을 보는 것만을 의미하면 단순히 시청에 그칠지도 모르는 일이고 실제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존심 싸움, 소모적 논쟁만 가득하면 이를 통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요?

이승주(경영 4): 이동건 학우 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동건(경영 3):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주제의 가정이 전희은 학우 분이 말한 것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희은 학우 분은 토론을 통해 특정한 합의나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토론을 통해 서로 갑론을박하는 과정 자체가 참여자들의 경제, 정치적 지식 수준을 올릴 수 있고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상향 평준화 시켜서 이 경우 집단지성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 똑똑해진 유권자들에게 선심성 공약을 하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주제의 가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희은 학우 분이 우려한 결론 없는 토론 자체는 지금 논의되는 주제에서 큰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은(경영 2): 네 저도 동건이 형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토론에서 갑론을박하는 과정 자체가 참여하는 국민들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가정도 한번 의심해 볼만 한데요,

쉬운 예로 대통령 후보들이나 서울 시장 후보들이 공개 토론을 하면 서로 인신공격 하는 데에 더 치중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로 정책의 유효성을 두고 건전한 토론이 진행되기보다 박원순 후보의 학벌 논란과 관련하여 도덕성에 대해 계속 물고 늘어지는 소모적인 토론이 주로 이루어 졌잖아요.

그래서 참여자들의 시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론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신공격적 흐름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주(경영 4): 네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종합하자면 토론을 통한 집단지성과 국민들의 시사 수준 강화로 과잉 입법의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의 각 연결고리마다 어떤 위험 변수가 있는지 꼼꼼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한 국민들의 집단지성 강화도 실제로 의도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려면 어떠한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입법 과잉 문제가 규제되기 위해 집단지성 강화 말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씩 의견 제안 부탁 드립니다.

최윤진(경영 2): 저는 국회의원 수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교묘하게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그 사람들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이 열 받고 짜증나요.

그래서 국회의원 정원수가 줄면 후보들끼리 경쟁이 더 강화될 것이고 그나마 자질 있는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동건(경영 3): 행정학 교과서에서 많이 언급되는 예결특위를 상임화시키는 제도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규제방안이라고 봐요.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시행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하네요.

대신 보여주기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면 상임화시킨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감시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재은(경영 2): 음 그런데 상임화된 예산 결산 위원회를 어디서 내부 감찰을 하느냐도 애매한 거 같아요. 예산 결산 기능을 국회에 둔 것 자체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취지인데 감사원이 예결위를 감찰하면 결국은 행정부가 입법 기능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이승주(경영 4): 전희은 학우 분은 예산결산위원회의 감찰 주체는 어디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희은(경영 2): 국회 내부에 두는 것은 어떤가요? 국회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감사원에서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를 감찰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봐요.



이승주(경영 4):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어서 의원입법 과잉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규제방안들 아이디어 제시 부탁드립니다.

전형진(경영 2): 저는 국민정서법을 이용하고 싶어요. 언론에 특정 시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집결되면 소송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부정부패, 직무유기의 국회의원들 탄핵이나 축출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 인터넷을 이용한 사퇴 운동 등이 활성화되고 이것들이 언론의 힘을 얻어 국민정서화되면 정치권에서도 내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필(경영 3): 국민들의 강한 반감을 사서 퇴출 운동이 이루어지고 축출되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실효성 있는 규제라고 할 수 있으나 특정 세력들이 악의를 가지고 이해관계에 반하는 당이나, 지역구의 특정 국회의원을 의도적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생기면 규제의 취지에 어긋날 것이라고 봅니다.

강승모(신방 4): 사실 강용석의원이 축출되는 과정을 보면 아나운서 집단이라는 특정 세력의 공분을 사서 정치권에서 어쩔 수 없이 퇴출을 시킨 것인데 강의원을 개인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지만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국회의원 신분 자체는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정서법, 특정집단의 매도에 의해 의원들이 퇴출되는 제도가 관행이 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예외 사항이 계속 생기다 보면 법 질서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주(경영 4): 네 의견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입법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논의해보았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⑪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희철(경영3), 박동민(경영3), 최승효(경영3)

임성현(경희경영 3): 오늘은 '국회의 입법과잉,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법 같지 않은 법'을 입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 같지 않은 법에 대해 살펴보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 같지 않은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자 말씀해주십시오.

최승효(경희경영 3): 저는 게임중독법을 들고 싶습니다. 최근 게임 산업이 발달하면서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세계에서 손에 꼽힐만큼 잘 발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한국 게임사에게 많은 자본을 지원하겠다며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많은 게임 회사들이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게임중독법이 시행된다면 우수한 게임사들이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힘들다고 봅니다.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게임중독법이 생겨나면 술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류금지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저 또한 게임중독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 같지 않은 법'으로는 국회의원 연금법을 꼽고 싶습니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사람이면 65 세 이상부터 누구나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들어도 국회의원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면 이러한 연금을 주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회의원들이 과연 연금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을까요?

더욱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법안을 두고는 엄청난 대립과 다툼이 있었는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연금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의원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박동민(경희경영 3): 저는 청소년법을 꼽고 싶습니다. 청소년법의 취지 자체만 보면 정말 괜찮은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청소년 범죄 수가 늘고 있고 범죄의 수준 또한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법으로 청소년을 감싸고 도는 것이 옳은지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택시 대중교통법 또한 택시기사라는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요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표심을 잡으려고 법을 마구잡이로 입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성현(경희경영 3):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법 같지 않은 법'에 대한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특정이익집단을 위한 법, 국회의원 연금법이나 택시 대중교통법 등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엉뚱하게 쓰일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입안해야 할 법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택시 대중교통법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택시기사들은 아주 평범한 국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의원을 선출한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고 특정이익집단에 속한 사람들도 투표권이 있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과연 '법 같지 않은 법'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를 국회의원의 탓이라고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주면 투표를 해주는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국민들에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저 또한 '법 같지 않은 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국회의원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후보자들이 당선되기 위해 지나치게 무리한 공약이나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말도 안되는 공약을 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보자가 내놓는 공약이 단순히 자신들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해서 투표를 하는 국민들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내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입법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볼 때 국민들이 의원들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자질이 부족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그런 의원들이 '법 같지 않은 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이 낸 공약, 그간의 행적 등을 판단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효(경희경영 3): 국민들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점에 저 또한 동의를 합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후보자를 선택하고 싶어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냉정하게 판단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고향인 강릉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원주-강릉간 철도 설립만 보고 모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2013 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었던 공사는 현재 2017 년까지 미뤄진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미뤄지자 강릉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시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애초에 임기 내에 힘들었던 사업이었음에도 공약을 내건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 투표를 한 국민들이 더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고 투표했기 때문입니다. 울진에 있는 공항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지어진 공항이었지만 지금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폐쇄직전의 상황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들이 잘못 투표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봅니다.

박동민(경희경영 3): 제 고향인 창원의 경우 한동안 '마창진 통합'으로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마창진 통합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에 각 지자체마다 이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였는데 야구장을 어디에 건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었습니다.

창원통합시가 야구구단 NC 를 창원으로 유치하면서 내세웠던 조건이 마산이나 창원에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막상 NC 가 창원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진해에 야구장을 세우겠다고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마다 이권을 챙겨가기 위해서였습니다.

NC 구단은 물론 통합시민들과 많은 국민들이 반발을 했지만 통합창원시는 이미 통합하기 전에 이러한 결정을 해서 바꿀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공약을 제대로 보지 않고 투표한 뒤 후회하는 국민들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승효(경희경영 3):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면 무조건 당선시켜주는 국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공약이라도 본 국민들이면 그래도 후보자를 지지할 이유라도 가지고 투표를 하지만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만 보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살았던 강릉이나 방금 언급된 창원 등도 특정정당만 지지하면서 그 정당에서 나온 후보자의 역량은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대로 판단도 안하고 투표하는 국민들이 과연 앞에 언급된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성현(경희경영 3):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후보자들만 선출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공약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지역이기주의가 많이 남아있고 이러한 이기주의 때문에 투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포함한 국민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희철(경희경영 3): 우리 국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의 투표로 대통령은 5 년, 국회의원은 4 년이라는 기간 동안 각자의 업무를 하게 되는데 한 순간의 선택이 향후 우리나라의 4,5 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자라는 기존의 구호보다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과 의원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자기 지역만을 위한 후보자가 아닌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지역주의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주의도 좀 사라지게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박동민(경희경영 3):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이나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을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눠주신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의 '시민교육'과 같은 교육이 우리나라에도 생겨나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승효(경희경영 3): 투표에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가 아닌 질적으로 수준 높은 투표를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곧 우리 사회의 핵심이 될 20 대의 경우 겉으로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척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들어보면 무조건 어떤 정책이나 정당에 이유 없이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투표율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 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실망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치판을 보면서 다음 선거에는 어떻게 투표할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수준 높은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임성현(경희경영 3): 투표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좋은 정치를 위해 국민들부터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⑫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오른쪽으로 김동훈(철학4), 김예지(전자물리3), 김장준(전자물리4)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째, 국회의 입법과잉 중 특정이익집단에 대한 법률개정에 대해 토론을 둘째, 입법과잉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김광래(재무금융 4): 우선, 특정 이익집단에 대한 법개정의 원인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제가 칼럼을 작성하면서 로스쿨제도, 중독법 등 여러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제일 큰 원인은 기득권층의 장악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로스쿨제도 같은 경우 현 시대 음서제라 불리지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많이 이용되고 과학고, 외고 출신들이 이미 기득권층이 장악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등록금이지만 폐지가 되지 않는 것도 기득권층에 하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구요

김동훈(철학과 4):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일단 로스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각 대학들이 들인 돈이 수백 억은 기본이었고요. 신규 교원채용, 신규 건물 신축, 신입생 입학 및 재학생 관리를 위한 관리 인력 및 시설 지출 등 또한 요즘 이슈가 되는 각종 민영화나 중동법 등도 특정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예지(전자물리학과 3): 일단 민영화나 각종 법률에 대해선 현재 메디텔이랑 원격진료는 민영화와는 거리가 있죠. 다만 중소도시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생각해서 민영화 딱지를 붙인 거로 보이네요. 지금 공기업 부채도 문제긴 문제죠.

이번에 무디스 같은 신평사에서 공기업 부채를 문제로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기도 했고요.. 그 방법이 민영화라면 문제가 되고 논란이 일겠지만, 공기업수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5 시 칼퇴근 하고 만년 적자내면서도 성과급 파티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니...

김장준(전자물리과 4): 누가 봐도 나라와 일반 시민들에겐 이익이 아니죠. 정치인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자기들 얘기가 아닌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이지만 본인들은 피해가 아니라 이득 볼 수 있기 때문에 법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개정을 하더라도 할 분야가 있는 거고 하지 말아야 할 분야가 엄연히 있는 겁니다. 설령 자본주의 기본경제개념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여러 사례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잇죠.. 더불어 공기업의 부정적이고 방탕한 경영을 개선해간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법개정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자꾸 특정이익집단만 생각하고 건드니까 현 정부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법개정으로 인해 생기는 그 이익의 파이는 누가 나눠먹을지도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강행한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김광래(재무금융학과 4): 세부적인 결정 진행 등을 알지는 못하지만 법개정을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한 정치인들이나 의학계 비리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봐요. 기간산업에 대한 건 국가가 쥐고 있는 게 맞다고 보지만요.

그럼, 본격적으로 입법과잉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대안점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양산된 규제 법안들이 부작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1000 여 개씩 쌓이는 각종 규제가 국민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동훈(철학과 4): 우후죽순 의원 법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규 규제 신설을 억제해야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잉입법이 생긴 결정적인 이유는 의회의 입법기능이 강해지면서 의원발의 법안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2000 년 개원한 16 대 국회에서 4 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651 건이었지만, 17 대 국회에서는 5728 건, 18 대 국회에서는 1 만 1191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19 대 국회는 1 만 7000 건에 달할 전망이구요 이는 월평균 350 건 꼴입니다.

19 대 국회에서 논의한 법률안의 약 15%는 규제를 위한 법안이지만,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국규제학회가 19 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 법률안 474 개를 평가한 결과 '규제 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에서 평균 2.99 점(5 점 만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규제 수단의 적절성' 점수도 2.92 점에 머물렀습니다.

효과도 불확실한 규제 법안이 의원들 손에서 양산되는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봤는데요. 공무원과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관련법은 직접적인 재정지출 없이도 정부 권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면 전문가들의 규제영향 분석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슬쩍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예지(전자물리학과 3): 저는 의원발의안도 규제영향 살펴야 과잉입법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소외된 국민을 위해 시작된 규제가 이제는 질투심과 보복심에 기초해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를 강화한다면 인기에 영합하는 규제 법안이 줄어들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과잉 입법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장준(전자물리학 4): 과도한 정부 개입도 과잉입법 부작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무제한적 개입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이 왜곡되고,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부개입은 '국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악화시킵니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의 복지개입은 결국 국가부도 위기까지 내몰았죠.

정부는 주인인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국가부채 규모를 숨기거나,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남발했습니다. 재정을 건전화하기보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를 쓰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시도하다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발표했다가 중단되다시피 했고, 노인기초연금도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 조만간 터질 거품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광래(재무금융학과 4): 저도 약자를 돕는 법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지만 업무는 지역민원 해결이 아니라 국가적 정책입니다. 국회의원을 지역에서 뽑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해당 입법부의 무차별적 시장 의원입법은 국회의원 10 명 이상이 찬성하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이 발의하면 서로 품앗이처럼 찬성해주죠. 이 안에는 소비자보다 생산자를 보호하는 퇴행적 법,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법, 사적 계약을 부정하는 법, 국내기업의 손을 묶는 역차별법 등이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인 법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법'입니다. 당초 이 법은 대기업들의 일감이 가족회사 대신 다른 중소기업에 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법에 걸린 기업의 98.5%가 중소·중견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이 법을 없애달라고 할 판입니다. 당사자 간 계약에 맡겨야 할 '프랜차이즈 이익보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포를 연 뒤 특정한 이익이 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점주가 보상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입법부가 이익의 범위까지 보장해주라는 넌센스입니다. 특정 거리 내 파리바게트 신규출점 금지, 대형마트 정기휴업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잉법률안이 오히려 시민들을 해하고 있다.

김동훈(철학과 4):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미국을 예로 들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미국의회도 금융위기, 역외탈세 등 굵직한 현안이 발생하면 청문회를 통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을 소환합니다.

즉, 증인 채택에는 기업인, 민간인 등 예외가 없지만 절차적인 정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CEO 가 2~4 시간을 기다려 평균 5 분 내외의 답변을 하는 비생산적인 한국형 기업국감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의회는 감사기능이 있지만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미국의 CRS 는 전문성과 비 당파성, 객관성, 기밀성을 지키는 보고서를 제공해 전 입법과정에서 의회를 지원하고 있고 CRS 조사업무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보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CRS 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사안에 필요한 모든 전문가를 한데 모아 그 사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보고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미국 또한 법안이 많이 생기기는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법안 발의 후 위원회를 거치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을 거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하는 법 자체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김예지(전자물리학과 4): 저도 원인을 찾아보았는데요. 정부입법의 경우 규제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회제출 이전에 공청회, 입법예고,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협의해 규제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원발의 법률안의 형식으로 법안을 제정하는 '우회입법' '청부입법"차명발의'가 이뤄지는 것도 이런 제도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잉입법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 비용추계제도를 실행해 입법을 실행한다면 국가와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하고 법안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평가해 정책의 파급효과가 어떠한지를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김동훈(철학과 4): 저도 윗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미국처럼 특수기관을 만들거나 법 나올 때 까다로운 심사와 비용을 주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광래(재무금융학과 4): 우리나라 과잉입법의 사례들을 보면서 엄청난 숫자의 법률안 통과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말고사 공부 중에도 토론을 도와주신 3 분께 감사합니다.

⑬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민정(동아국무 3): 귀한 시간 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회의 입법 과잉,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해마다 쌓이는 1000 여 개의 규제 법안들은 국민경제 회복에 타격을 주고, 월평균 발의되는 350 여 개의 법안들로 필요한 법안들이 처리지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입법 과잉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호성(동아국무 2): 국회에 너무나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면, 중요한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에게 그 손해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어떠한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알고자 한다면 그 발의된 법안을 알리는 거나 홍보하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도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 국회의원이 어떠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지를 확인하고, 공약을 잘 지켜 나가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그 성과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남기(동아국무 2): 국회의원수는 300 명인데, 발의되는 법안들은 만 개가 넘습니다.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 법안들도 만여 개의 법안들에 묻혀 처리 지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의 우선순위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슷한 법안들이 서로 협의 없이 무더기로 제출하는 경향도 있는 거 같습니다. 비슷한 정책을 선호하는 국회의원들끼리 편성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면서 1000 개 발의될 법안을 더 합리적인 법안 100 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석(동아국무 4): 네 저도 입법 과잉 현상으로 인해 비슷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국회의 절차는 법을 발의하는 것이 간소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안을 하나 제출할 때, 국회의원들이 그 법의 목적과 효과 등을 적은 보고서를 제출해서 그 법안들을 검토해보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박라실(동아국무 1): 14 대 국회부터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 수도 증가 하였고 발의되는 법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힘이 강해져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발의되는 법안들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까다롭지 않고, 그에 따른 규제가 없기에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입법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 절차를 다시 검토하고,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민정(동아국무 3): 저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 법안과 성과들을 평가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도 어느 정도의 경쟁 시스템이 있어야, 국회의원들의 능력이 더 발휘되고 더 좋은 법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황남기(동아국무 2): 국회의 입법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성과급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우선 과잉을 막기 위해 그에 따른 규제부터 먼저 시행되고 그 차후에 성과급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제도로 더 많은 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으로 성과를 부풀리거나 성과급제도를 악용하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성과급제도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민정(동아국무 3): 네 황남기 학우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황남기 학우님께서는 입법 과잉 현상을 막기 위해서 성과급제도보다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황남기(동아국무 2): 국회의원들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정책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그 토론을 통하여 입법 발의를 줄이고, 더 합리적인 법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석(동아국무 4): 저는 국회를 감시하고, 국회의원들의 법안을 검토해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하거나 같은 법안들이 반복적으로 발의되면 그 법안은 이미 발의되었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준다면 국회의원들의 수고도 줄어들고, 입법 과잉 현상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호성(동아국무 2): 저는 법을 적정 기준을 세워, 카테고리 별로 세분화시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들을 카테고리 별로 나눈다면 비슷한 법안들이 조금 걸러지지 않을까요?

또 국회의원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여 뉴스, 신문,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도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요?

박라실(동아국무 1): 국민들은 국회에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어떤 입법이 통과되었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국회를 감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 입법 과잉 문제도 우리의 무관심이 한 몫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올릴 수 있게 홍보를 하고, 국회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이 생겨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정(동아국무 3): 19 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 중 15% 정도가 규제에 관한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법안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억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급제도가 시행되면 국회의원들의 끊임없는 능력경쟁으로 규제보다 우리에게 더 합당한 정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학우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남진석(동아국무 4): 국회의원들이 규제법안들은 이 법안이 왜 생겨야 하고, 이 법안 시행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또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발의되는 거 같습니다.

그 예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법입니다.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우리나라 프로게이머들은 세계에서 높은 순위를 자랑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규제만 한다면, 프로게이머나 게임산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법이 꼭 필요하고 얼마나 청소년들을 보호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고, 규제가 많아진다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규제가 생겨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규제 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을 판단하지 말고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그 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소를 잃어버리지 않게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박라실(동아국무 1): 저는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아청법이 떠오릅니다. 이법은 아동 성법죄의 증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는데요. 과연 이법이 시행되고 아동 성범죄가 줄었을까요? 아청법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잘 살고 있는 남자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정책부터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규제의 목적에 맞지 않는 법안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만 생겨나고, 그 법을 다시 개정하고나 없애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입법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정(동아국무 3): 네 학우님들의 다양한 생각 잘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성과급제도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고, 성과급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다른 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급제도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시행되었으면 좋을까요?

황남기(동아국무 2): 성과를 평가할 때,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이 깨끗하게 평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도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그 성과를 알아 준다면 국회도 바뀌지 않을까요?

엄격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여 그 누구도 성과급제도에 관여할 수 없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국회의원들끼리 공정한 능력경쟁으로 조금 더 발전된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호성(동아국무 2):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을 만들 때, 시민단체들도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익과 상관 없이 활동하는 단체고 국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대변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당선되기 위해 내세웠던 공약들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도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달성 정도와 순위를 매겨서 공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관심가질 수 있는 정치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나아가는데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김민정(동아국무 3): 네, 정말 감사합니다. 국회의 입법 과잉 문제에 대한 학우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회의 올바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국회의 입법 과잉, 어떻게 할 것인가와, 입법 과잉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성과급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동아대학교 학우님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⑭ 부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수창(부산신발4), 김단희(부산언정4), 조유민(부산신발4), 손윤령(부산경영4)

김수창 (부산신방 4): 다들 시험기간인데다 조별과제로 한창 바쁠 시기인데도 이렇게 시간 내어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국회의 입법 과잉,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국민들을 입법 과정에 참석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발제문을 다들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4 년 17 대 국회 이후로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안의 수와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안의 수가 상당히 불균형한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는 의원발의 법안의 수가 정부제출 법안의 수보다 7 배 이상 많습니다.

과거 정부제출 법안의 수와 의원발의 법안의 수가 거의 동등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민 정부 시기에 비해 의원발의 법안이 실제로 가결되는 비율이 약 3 분의 1 로 줄어든 13.6%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에 의해 정치적으로, 그리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기인하여 쓸데없는 법이 양산된다는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률이 13.6%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약 86% 의 법안들이 가결되지 않고 폐기된다는 뜻이지요.

이는 바로 정부제출 법률을 제출할 때는 '입법규제심사제도' 라는 것이 존재하는 데 반해 의원발의 법률안에는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원' 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입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국민들을 입법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유민 (부산신방 4): 21 세기는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이 바로 SNS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지요. 비단 SNS 가 단순히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입법 참여 수단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유민 (부산신방 4): 먼저는 페이스북을 활용한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이나 다른 토론자 분들도 이미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에는 이미 '대한민국 국회'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에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컨텐츠들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국민들을 입법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페이스북이 현재로서는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회' 페이지에는 '어떠한 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가는가' 라는 정말로 실효성 있고 국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내용보다는 '국회의장이 어디가서 뭘 하느니, 누구를 만나느니' 와 같은 시시콜콜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번 토론 주제를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페이스북의 '대한민국 국회' 페이지를 검색해 봤는데 웬걸, '대한민국 국회' 공식 페이지의 좋아요 개수가 단 10,000 개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회' 와 같이 민주 공화정제 국가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중 하나를 지니고 있는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 페이지의 좋아요 수가 너무 적어서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유민 (부산신방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좋아요' 를 안 눌렀지요. (웃음) 이렇듯 '대한민국 국회' 페이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컨텐츠를 담지 못함으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SNS 가 국민들의 입법 참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 페이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입법 관련 정보나 흐름, 소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입법에 있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위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즉 입법과 관련된 정보들을 의원발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입법 찬반 투표 링크 페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국회 트위터 활성화는 물론 SNS 를 통한 국민의 입법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역시 조유민 학우님께서는 언론 학도답게 SNS 를 통한 국민의 입법 참여 방안에 대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웃음) 그렇다면 다른 학우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단희 (부산언정 4): 저도 조유민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입법 참여 방안이 바로 SNS 를 통한 방안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활용한 방법은 저 또한 나름대로 괜찮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은 줄곧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는 자신의 팔로워나 친구가 많다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마구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한 국민들의 입법 참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다양한 글들이 많은 공간에서 입법 관련 정보를 일일이 찾아내어 입법 규제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은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말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글들이 공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더구나 트위터의 경우에는 최대 글자 수가 140 자 밖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0 자는 발의하려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하기에도 모자란 글자 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국민들의 입법 참여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영상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영상 관련 플랫폼이 흥미도 끌고 더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김수창 (부산신방 4): 영상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입법 규제 과정에 참석시킨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창의적이면서도 독특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국민의 입법 참여로 연결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단희 (부산언정 4): 엄밀히 말하면 유투브도 SNS 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유투브 또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동영상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주기적으로 어떤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가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시키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우선 영상은 시각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입법 관련 정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입법에 대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이용 목적 자체가 정보를 얻거나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접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예로 과제나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유투브는 단지 놀거나 쉴 때,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접속하는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과제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찾을 때도 많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영상 매체, 특히 '유투브' 라는 SNS 를 통한 국민들의 입법 참여가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에서 어떠한 법안이 발의되어 통과되고 있는가를, 너무 무겁고 딱딱하게는 말고 대학생들의 눈에서 바라본 입법 과정이나 그 법에 관한 학부모님들의 입장 등을 영상으로 재밌게 풀어 시리즈 물로 제작한다면 보다 특이하면서도 인상 깊게 기억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입법 규제 방안에 참여하는 형식에 관해서는 조유민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찬반 투표가 담긴 링크를 영상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다 보고 나야 그 링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김수창 (부산신방 4): 네, 김단희 학우님께서는 조유민 학우님과 마찬가지로 SNS 를 통한 국민의 입법 참여 방안에 대해 재미있고 참신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윤령 학우님께서는 국민들을 입법 규제에 참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손윤령 (부산경영 4): 저 또한 김단희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쉬우면서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SNS 라는 온라인 입법 규제 방안이 아닌 오프라인을 활용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입법 규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입법 과정'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듣기만 해도 딱딱한 주제처럼 들리지 않나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과 전공 수업인 '상법' '세법' 같은 과목은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골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걸요. (웃음)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입법 과정'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아 이건 정말 딱딱한 주제구나.' '되게 어려운 주제구나' 라고 지레 겁부터 먹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을 입법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쉽고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기업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홍보대사' 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대외활동' 과 같은 것을 말이지요.


'입법 홍보대사' 와 같은 대학생 대외활동도 국민 입법 참여의 방안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사회자님께서도 현재 '선진화 홍보대사' 활동을 하시면서 평소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정치, 경제, 사회 면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은 물론이요 이전보다 더 흥미를 느끼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김수창 (부산신방 4): 그렇습니다. 사실 저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면에 있어서 상당히 무지한데다 신문방송학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나오는 정치, 경제면은 거의 읽어본 적이 없어 신문 기사를 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았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웃음)

손윤령 (부산경영 4):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지요, (웃음) '선진화 홍보대사' 처럼 입법기관에서도 '국회 홍보대사' 나 '국민 입법 홍보대사' 와 같은 제도를 유치하여 국민들이 입법 과정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선 대학생 홍보대사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입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올바르게 교육시킨 다음에 입법 과정을 체험하도록 한다든지, 다양한 이벤트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그들이 입법과정에 대해 충분이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손윤령 학우님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이벤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손윤령 (부산경영 4):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입법 홍보대사' 인 만큼 지금 국회에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가를 충분히 숙지해야만 맞출 수 있는 O, X 퀴즈를 시행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홍보대사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각자의 이벤트나 블로그 등에 홍보를 하여 '입법 홍보대사' 가 아닌 다른 네티즌들도 지금 어떠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검토되고 있으며 입법 홍보대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숙지시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손윤령 학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 또한 다양한 네티즌들로 하여금 입법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주로 20 대를 타깃으로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연령층까지 아우르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손윤령 (부산경영 4): 더 나아가서 '어린이 입법 홍보대사' 나 '어린이 입법 과정 체험' 등을 만들어서 입법이나 국회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그리고 국민의 입법 참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어릴 적부터 숙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어린이 입법 홍보대사' 나 '어린이 입법 과정 체험' 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하면 어렸을 적에 느꼈던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기억들이 지속적으로 입법 과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내 친구나 아들, 딸이 이러한 것을 홍보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호의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단기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본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김수창 (부산신방 4): 세 학우 분 모두 정말 신선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입법 과정에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각자가 말씀해 주신 방법들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도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홍보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유민 (부산신방 4):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SNS 를 통한 홍보 방안,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에 다양한 입법 관련 정보나, 현재 통과되고 있는 법에 대한 동향들을 제시한 다음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요. 저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회자님은 수업 시간에 〈EBS 다큐프라임: '킹 메이커' 3 부 - 당신들의 선거운동은 석기시대의 것이다〉 라는 영상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수창 (부산신방 4): 네, 처음 수업시간에 그 영상을 틀어준다고 했을 때, '아싸! 오늘 영상 보는구나!' 라며 행복해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감상문 써 내라' 는 교수님의 천청벽력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리포트 쓰기 싫다고 투덜거린 기억이 나는군요. (웃음)

조유민 (부산신방 4): 그 영상을 보면 2012 년 미국 대선 때 민주당 오바마 선거운동 본부에서 마이크로 타겟팅과 빅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선거 운동을 선보였던 내용이 나옵니다. 오바마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기본 데이터로 시작하여 대대적으로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마크이로 타게팅. 즉, 성별, 지역, 나이, 직업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기반으로 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기에 기본 민주당 당원 데이터와 더불어 2008 년 선거 데이터까지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메일로 푸쉬 알림을 보내서 국민들에게 '맞춤형' 으로 선거 참여를 유도하였지요.



미국에서는 2008년 대선 때, 국민 맞춤형 선거 운동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법부도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법 동향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를 누르게끔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회 페이지를 '좋아요' 누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주제를 가진 법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바로 어떤 분야의 법안에 대해 '좋아요' 를 누르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법안에 대한 찬반 링크를 발송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 법에 관심이 있어 그것을 좋아요 누른 사람에게는 청소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찬반 링크를 발송하고, 식품 관련 법에 관심이 있어 그것을 좋아요 누른 사람에게는 식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찬반 링크를 발송하는 것이지요.

홍보에 있어서는 텔레비전 CF 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프라임 시간대에 방영하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전, 후로 국민들의 입법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를 전면 집행하여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김단희 (부산언정 4): 저는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신선한 시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미있는 UCC 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구독하면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하거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영상이 올라오면 그것 그대로 바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따라서 영상으로 입법 과정을 재미있게 각색한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채널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구독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지요.

손윤령 (부산경영 4): 저는 TV 광고를 통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입법 홍보대사' 제도를 알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외활동' 의 경우에는 TV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하지만 다른 기업체에서 시행하는 대외활동과는 달리 입법 홍보대사' 와 같은 것들은 TV 광고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체 대외활동은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지만 '입법 홍보대사' 는 공익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대외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급부상하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올드 미디어' 인 텔레비전의 파급력을 따라가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법 홍보대사' 만큼은 TV 를 통한 홍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요.

김단희 (부산언정 4): 저도 '홍보' 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대학생인 터라 손윤령 학우님께서 말씀해주신 '대학생 서포터즈' 를 활용하여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제도 또한 정말 참신하고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학교 앞에 QR 코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내가 대학생활 가운데서 수강신청을 하고, 강의평가를 하는 과정을 입법과정에 녹여 재미있게 표현한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는 '서포터즈'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유투브' 채널을 통해 동영상을 구독하는 시스템을 애용하고, 그것을 통해 학교 과제도 수행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여 활용도가 높다 보니 영상을 통한 국민 입법 참여 독려 방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웃음)

뿐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국민을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나 유투브 페이지를 구독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확인해주는 센스까지 있다면 지속성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페이스북 페이지는 '대학생 입법 홍보대사' 페이지도 따로 만들어서 네티즌들과 입법에 관련된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 공식 페이지와 거기서 주체하는 대외활동인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즈' 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조유민 (부산신방 4): 그리고 저희가 대학생인 만큼 만일 이것을 20 대의 연령층에게 홍보한다면 그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 PPL 을 통해 입법 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제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범죄 드라마나 법조인의 일상을 다룬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나 악역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면 입법부에서 발의한 법안을 드라마의 스토리에 개연성 있게 개입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의원발의 입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손윤령 (부산경영 4): 아니면 공익광고도 괜찮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미디어 랩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최로 '국민입법, 우리나라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라는 문구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공신력 있고 신뢰성 높은 공공 기관에서 '국민 입법' 관련된 공익광고를 주최함으로써 국민들이 '입법' 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실제적인 참여로도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인터넷 기사에 보도자료를 내보내 획기적인 체험활동이 있음을 광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올바른 입법 지식 갖기를 목표로 소위 '스펙' 을 쌓으려는 대학생들은 참신한 이런 활동에 관심을 보일 수가 있고, 또는 진심으로 정치나 의회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앞에서 말씀 드린 '입법 홍보대사' 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TV 광고나 온라인을 통하여 적절히 홍보를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조유민 (부산신방 4):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법과 관련한 것은 젊은 층의 관심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기도 하고, 냉소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입법 체험, 입법 캠프 등과 같이 젊은 층이 좋아하고 신기해 할만한 이벤트와 함께 입법 과정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활동이지요.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입법 캠프를 주최한 후, 캠프에 온 학생들에게 입법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진짜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역할극을 해보게 하는 그런 활동이 좀 더 홍보도 잘 되고 젊은 층의 눈길을 사로잡지 않을까 합니다.

김단희 (부산언정 4): 그리고 요새는 학교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NS 계정도 갖고 있던데 이미 있는 플랫폼에 홍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다시 시도하고 만들기보다는 이미 잘 되고 있는 매체와 함께 연합할 수 있고 더욱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국민 입법' 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법부에서 앞에서 저희가 말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현 입법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입법부의 노력이 있어야만 '국민을 통한 입법' 이 실현될 수 있으니까요.



김수창 (부산신방 4): 지금까지 저희는 국회의 과잉 입법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인 '국민 입법 참여' 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민 입법 참여' 를 유도 및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나 동영상을 통하여 법안의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오프라인으로는 대학생 홍보대사를 통해 '국회' 와 직접 소통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법 참여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SNS 에 기반한 맞춤형 법률안에 대한 찬반 투표 유도, TV 나 인터넷 기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입법 홍보대사 및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홍보, 입법 캠프를 통하여 직접 입법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지만 이미 여러 번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하셨던 학우 못지 않게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하나의 소중한 의견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나라가 '선진 대한민국' 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학기 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어 어렵게 참석해 주신 토론자 세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상 2013 년 12 월 5 일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⑮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한결(일본학과 4): 강원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 이야기할 주제는 '입법과잉'입니다.

여러분은 특별법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법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특정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의되는 법안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칼럼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차(茶)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보호하는 취지의 입법이 또 다른 차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읽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특별법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표하는 성격을 띱니다.

박윤지(정치외교 4): 하지만 저는 특별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법이 모든 위법행위를 커버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을까요?

박윤지(정치외교 4): 초등학생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발의된 특별법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시대별 범죄는 끊임없이 변하고, 범죄의 유형이나 대상도 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특별법도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란(일본학과 4): 저도 박윤지 학생의 말에 동감합니다. 최근의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들이 옛날과는 방법도 대상도 많이 달라졌는데 일반법이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김한결(일본학과 4):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신 관점으로 볼 때, 특별법은 꼭 필요하지만 19 대 국회에 접수된 7,536 건의 법률안 중에서 무려 80%가 특별법이라고 하니, 특별법의 과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는 법이 이렇게 남용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박유정(교육학과 4): 특별법안의 수가 그렇게 많은가요? 저는 일년에 한, 두건 정도가 발의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법을 발의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나 규제가 필요하면 어떨까요? 발의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법안의 발의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미란(일본학과 4): 시대의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꼭 필요한 특별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재대로 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지미란 학생이 이야기해준 '꼭 필요한 법안'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지 않을까요? 각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각자에게는 꼭 필요한 법안이나,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필요한 법안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러한 기준이 모호한데 이것에 관한 해결방법은 있을까요?

지미란(일본학과 4):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넣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각 집단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제기된 법안에 관해서는 입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한지 한번 검사를 받는 것이죠.

일본에서도 입법과정에 이러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제기된 법안에 관해서는 필요성이 올바른지에 관해 심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을 시사해준 일본학과의 지미란 학생

김한결(일본학과 4): 지난번 토론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기 위해 전과같이 지미란 학생에게 일본 법안제도에 관한 조사를 부탁드렸는데요. 조사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란(일본학과 4): 일본의 입법절차에는 '퍼블릭코멘트'라고 불리는 의견공모절차가 있습니다. 법령에는 "제정기관은 명령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널리 일반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저도 칼럼을 쓰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입법공모전'을 보면서 입법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네요.

지미란(일본학과 4): 의견공모에 있어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법으로 명시해 놓았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고려의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서도 결과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행정기관과 의견제출자와의 사이에 충분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지(정치외교 4): 만약 국민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무시하고 고려조차 하지 않는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시된 의견을 고려한 척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견에 대한 실천성을 강조한 정치외교학과 박윤지 학생

박유정(교육학과 4): 박윤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시된 의견이 심사숙고 중에 있다, 혹은 국회에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등의 실천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국민들도 신뢰감을 갖지 않을까요?

김한결(일본학과 4): 좋은 의견입니다. 국민의 참여로 많은 법안들이 제시되었다고 하여도 이것이 실제 얼만큼 논의되고 있는지 국민들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유정(교육학과 4):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전'과 같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의견제시가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국민참여가 꾸준한 환경이 무엇인지 박유정 학생께서는 생각해보신 방안이 있나요?

박유정(교육학과 4): 입법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를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준 박유정 학생

지미란(일본학과 4): 또한 꾸준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국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입법과정이 왜 중요한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홍보로서 보여진다면 국민의 신뢰도가 증가할 것이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입법기구를 믿고 더 많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제가 독일의 입법과정도 조금 조사해봤는데요, 독일에서도 법안의 예비단계에서는 전문가집단 및 단체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해단체가 입법계획 및 초안작성의 예비작업 단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합니다.

또한 2006 년에 새로이 설치된 국가규범평가위원회는 사전평가에서는 규제에 관한 모든 사항의 항목을 고려하여 규제 대안을 제시하고, 병행평가에서는 규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사후평가 단계에서는 법의 목적과 법의 사용여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박윤지(정치외교 4): 사후평가로서 법이 제대로 발의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는 우리도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네요.

김한결(일본학과 4):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그랬듯이 선진국은 법안을 결의하기 전에 앞서 국민들 혹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을 보면 국민의 참여가 너무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미란 학생의 의견처럼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또한 국민의 입법제안을 위한 정보공개나, 실천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원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에 걸친 선진화 연구모임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⑯ 울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정혜진(경찰3), 차은지(법4), 최정은(정외3), 최해정(경제4), 정주아(법4)

최정은(정외 3): 자, 이제 마지막 연구모임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대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해요. 2 차 연구모임은 우수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도록 이번 연구모임 또한 열심히 해봐요 우리.

이번 연구모임은 바로 어제 열렸던 제 80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국회의 입법 과잉,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어제 월례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에 칼럼을 쓰기 이전에 연구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제 급히, 월례토론회 주제와 연구모임 방향에 대해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 연구모임은 즉흥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특별법의 실태와 원인, 몇 가지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과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정주아(법 4): 최정은 학우님, 서울에 계시면서도 이번 달엔 무척 자주 보는 것 같네요. 어쩌다 보니 한 달에 연구모임을 두 번이나 하게 되었네요.

최정은(정외 3): 그러게요. 불과 3 주 전에도 연구모임을 하러 온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한 달에 연구모임을 두 번이나 진행하게 되었네요. 마지막입니다. 열심히 해보자구요^^

차은지(법 4): 법학과라 그런지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네요. 칼럼을 쓰고 연구 모임을 진행했으면 좋았겠지만… 요새 국회의 입법을 살펴보면 특별법이나 개정법이나 할 것 없이 발의건수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국회 입법 발의안 건수로 좌우된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겠지만요. 솔직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 자체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고,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몰라서 못 써먹는 법도 많잖아요.

있는 법도 모르는 마당에, 뭘 그렇게 법을 만들어 대는지, 그렇다고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정혜진(경찰 3): 맞아요. 진짜 저도 경찰공무원 준비를 할 예정인데,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법학과 못지않게 많은 법을 배우고 있는데 머리가 터질 지경이래요. 국민을 위한 법인데 국민들이 모르는 법이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법을 어찌나 빨리 만드는지 무슨 사건만 터졌다 하면 성매매 금지 특별법이다, 무슨 특별법이다 사건에 관한 특별법은 다 만들어 지는 것 같아요. 그런걸 보면 과연 기본법은 쓸모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구요.

최해정(경제 4): 알아본 바로는 지난 18 대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가 남발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당시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향의 특별법이 많이 발의되면서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입법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국회에서도 물론 남용되고 있을거고요!

정혜진(경찰 3): 저도 기사를 읽었어요. 또 이런 특별법이 즉흥적으로 발의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법안들과 상충되는 요소도 있고, 위헌의 요소도 검토하지 않은 채 발의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발의된 법안이 다 누구에게 돌아오겠어요. 국민들한테 다 돌아오죠.



정주아(법 4): 진짜, 국회의원들은… 참 답이 없어요. 포퓰리즘도 선거철에 반짝이고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자신들 잇속에 따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리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건지.

최정은(정외 3): 이번 연구모임은 특별법을 주제로 하는 만큼, 현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예시로 들 특별법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인데요. 이 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소개부터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성매매를 처벌한다는 특별법이죠.

예전부터 이 법안에 대해 찬반논쟁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물어보고 싶네요.

정주아(법 4): 저도 전공이 법학과인지라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은 찬성의 말을 들어보면 찬성도 일리가 있고, 반대의 말을 들어보면 반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특별법을 찬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성매매 자체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반대 쪽의 의견을 들어보니 성매매를 불법으로 취급하고 억압한다고 해서 어쩌면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도 있었을 법한 성매매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최해정(경제 4): 맞아요.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은데 사람의 본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법을 피해서 더욱 더 음성화되어 갈 가능성도 높고요.

차은지(법 4): 저도 반대의견을 듣고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법을 폐지한다는 건 성매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나 같다고 봐야죠. 그럼 더 많은 성매매 업자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정혜진(경찰 3): 성매매 특별법이 폐지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사실이죠. 저도 정주아 학우님과 생각이 비슷한데, 성매매 특별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지만, 이미 개정된 적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이렇게 대립이 심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양쪽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서 성매매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내용의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주아(법 4): 네, 저도 처음엔 성매매 특별법 찬성이었지만, 무조건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정혜진 학우님 말처럼 금지다 아니다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도, 일부 여성단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한다느니 하면서요. 여성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안전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법안도 딱히 좋은 특별법이라곤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최정은(정외 3): 어제 주제를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법 관련 전공자가 많아서 그런지, 심도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저도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지라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논의를 듣고는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네요.

정주아(법 4): 그러니까요. 성매매 특별법만 보더라도 어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특정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다니, 국회의원의 입법권의 힘이 막강하긴 한가 봐요.

최해정(경제 4): 그럼요. 저도 입법권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봐요. 포퓰리즘성 법안이 발의되는 것도 국회의원은 표를 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자신에게 표심을 실어줄 집단을 대변해 주면서 상부상조하게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 독점 입법권으로 인해 입법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국회의원 단독이 아닌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또 생각해본 게 법이란 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은 높으신 분이시다 보니 다른 높으신 분들과 접촉이 더 많을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하신 분들이니 일반 국민들과의 접촉 또한 포퓰리즘으로 시장에서 악수 정도로 끝나고 그렇지 않나요?

최정은(정외 3): 최해정 학우님 말 속에서 뭔가 울분이 터지는 것 같네요. 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대처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최해정(경제 4):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게 국민들의 소리를 국회의원이 많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입법을 할 때에도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는 거죠. 제가 대학생이라 그런지 요즘 똑똑한 대학생들 많잖아요?



입법과잉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측면의 규제가 필요하다

입법권의 일부를 각 대학교 총학생회에게도 나눠주든지, 아니면 입법활동을 할 때 대학생 대표를 선정하여 함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차은지(법 4):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회의원 분들의 나이도 있으시니까 대학생들의 참신한 의견이 반영된다면 더 좋은 법안이 마련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대학생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 지게 될 것이고요.

최정은(정외 3):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없으시네요. 최해정 학우님 말씀대로라면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대학생들에게 입법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해정(경제 4):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정치에 무관심한 대학생들도 한 번 더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정은(정외 3): 저도 대학생이라 그런지, 좋은 의견인 것 같네요. 그래도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의 보완을 한다면 입법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할 생각인데요, 마지막 연구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최해정 학우님의 열띤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법 남용의 실태와 성매매 특별법이란 법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특별법 남용에 대처할 대안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좋은 토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3 개월 동안 울산을 오가면서 여러분들과 사회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신기하기도 뜻깊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반만 아니었어도 선진화 포럼을 적극 추천하여 홍보대사가 되면 저도 연구모임에 동참해줄 의향은 있는데 아쉽네요.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번처럼 좋은 결과 있으면 바로 연락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진화 과제 6: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

(제 69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강소라(서울여자대학교 콘텐츠디자인학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현재 동북아의 정세는 마치 중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 같다. 각종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군사적·경제적 이해의 소용돌이 속의 중심에서 우리나라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각 나라, 각 사안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샛별로 빛날 수도 있고, 별똥별처럼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정세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까? 미국은 우리나라의 경제적·군사적 우호국이다.



미국은 스스로 전 세계의 치안과 보안, 안전, 평화를 지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에 각종 국제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관심이 동북아로 모여지고 있다. 미국은 분명 동북아 문제의 조력자,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분쟁해결을 미국의 이해에 따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과 일본이 자신의 이익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의 조정에도 그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타국 간 분쟁 시 우리나라의 역할은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눈치싸움을 하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에서 만큼은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중국과 일본 간 분쟁들은 우리나라가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큰 여파가 미친다.



이 때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에 참여하게 된다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 타국의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경우, 타국도 우리나라의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의견 제시 정도의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간 역사문제와 국토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이해관계에 부딪힌다. 이 때는 눈치싸움이 아니라 힘 싸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중국, 일본과 정면으로 부딪히기엔 아직 우리나라의 국력이 충분치 못하다. 이 때는 미국과 그 외의 국가들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지혜롭게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김재원(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1990 년대 초반 탈 냉전 시기 이후 다시 한 번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면서 미국과 동맹체제를 이어온 한국. 더불어 북한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을 활용해 혼란스러운 동북아시아 질서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올해는 동북아시아와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동시적으로 지도자가 바뀐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영토 문제가 공론화되어 긴장감을 안겨줬다. 더불어 북한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리더십 체인지
미국: 균형 주장하는 오바마
동북아시아와 관련되는 국가 중에 미국에서 가장 먼저 대선이 치러졌다. 민주당의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다. 강한 미국을 제창했던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와는 달리 균형을 주장한 오바마의 재선은 동북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기본적으로 오바마 차기 정부는 중동국가를 비롯하여 중국 그리고 북한 등 상대적으로 관계가 껄끄러운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화적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가운데에 동북아시아를 살펴본다면 단연 한반도 문제와 중국 문제가 손에 꼽힌다. 소련 붕괴 이후 단일 패권적 성격의 행보를 달려온 미국에게는 중국이 그 부분에서 제어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가장 마찰이 예상되는 건 국방 문제 즉 안보적 차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파, 민족주의 재 등장한 일본

일본의 경우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지난 해 있었던 원전 사고 및 쓰나미 피해로 일본 내에서는 내셔널리즘이 조장되고 있다. 약한 일본이 아닌 강한 일본을 주장하여 극우파가 등장하여 인기를 얻고 있다.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의 민족주의적인 행보가 문제가 되는 것은 19 세기 말, 그리고 20 세기 초, 중반 제국주의적 행태의 일본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영토분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만 봐도 외교적으로 적잖이 마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의 독도 문제, 중국과의 댜오위다오 문제 그리고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토분쟁은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와,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결단이 일본에게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족주의적 움직임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에게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은 이런 점도 충분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동북아시아 단일 패권 중국?

다음은 중국이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체제로 전환됐다. 중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최근 일본을 제치고 미국을 견제할 만큼 대단히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중국 상위 계층 10%가 전체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 발전과 여러 소수 민족에 대해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일본과의 영토문제가 가장 이슈화 돼 있는데, 지혜로운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아시아에서의 패권국으로 발돋움 하려는 야욕으로 보는 우려도 있는데 이러한 우려가 번식되지 않도록 중국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동아시아의 다자간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패권국가로서 나가겠다는 움직임이 진행된다면,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신호를 안겨줘 새로운 우려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 체제 하에서 균형적인 외교 관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북한 포용, 미, 중, 일 중간자적 역할 필요한 한국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간에 이러한 혼란스러운 동북아시아의 질서 속에서 가장 원만한 외교적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북한 문제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을 배제하고 나가는 인식을 안겨준 지난 5 년과는 달리, 북한을 포용하면서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다자간 대화 모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북한문제가 걸려 있는데, 북한이 중국과 더 긴밀하다고 보는 주장, 분석들도 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사실 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국제사회에 보다 공론화시키되 그 가운데서 정치적 욕심,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닌 국제 평화를 위해 좋은 인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역시 영토문제가 얽혀있다. 북한과 NLL, 일본과 독도,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과 이어도 문제까지도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토의 소중함과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고, 미국과의 동맹은 중국과 북한에 영향을 주며 반대로 경제적으로 큰 시장인 중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징이 여러 이해관계를 낳았다. 그러나 복잡해 보이는 이 구조가 한국에게 반드시 골칫덩어리만은 아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보다 경쟁력 있고, 외교적으로도 신뢰의 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③ 김정원(경북대학교 경영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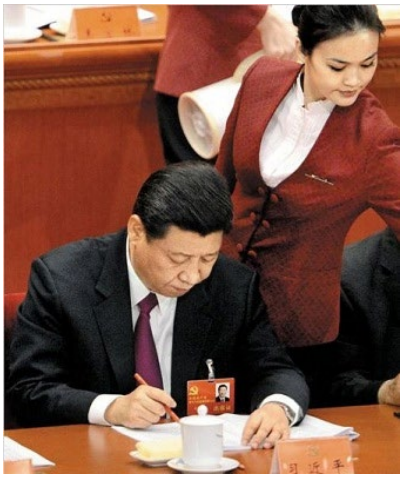
지난 8 일, 중국 공산당 18 차 당대표 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습니다. 14 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당대회에서는 2 천 2 백여 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18 기 중앙위원 2 백여 명과 후보위원 160 여 명을 선출했습니다. 당대회 폐막 후 11 월 15 일, 시진핑 부주석은 당내 최고 권력자인 총서기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후진타오 체제 10 년 이후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변화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시진핑, 그의 정치적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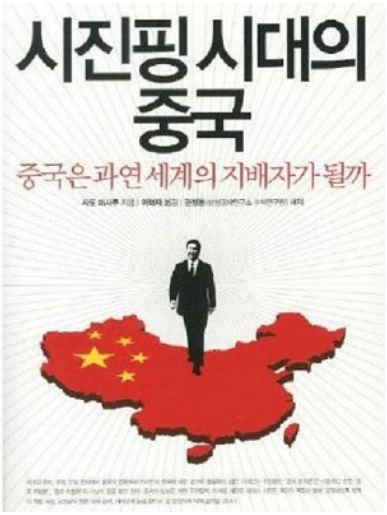
그가 정치적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이른바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파의 리더인 후진타오 주석이 상하이방(상하이를 기반으로 입신한 정치인)의 대부로 통하는 장쩌민 전 주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시기인 지난 2006 년입니다. 당시 상하이방의 일원인 천량위 상하이시 당서기의 비리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 전 서기는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경제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다 체포돼 부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하이의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중국 최고위층은 화합과 단결을 중시하는 시 총서기가 이런 상황을 수습할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상하이 당서기로 임명하게 됩니다.

태자당 소속인 그는 상하이 당서기에 취임한 뒤 이 사건을 무난히 수습하게 되었고, 이때 공청단파와 상하이방 양쪽에서 "정치력 있는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 총서기는 그 직후 열린 2007 년 10 월 당 17 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면서 차기지도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시진핑은 어떤 인물일까?

사토 마사루가 지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에서는 시진핑 총서기를 한마디로 '현장주의 프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53 년 6 월 베이징에서 태어난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원로인 시중쉰의 아들로서 태자당으로서 혜택받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정치투쟁에 휘말려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문화혁명 시대에 중국에서 관료화를 막기 위해 당원과 간부를 농촌이나 공장에 보내서 노동에 종사시키게 하는 하방을 7 년 간 겪고 난 뒤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당으로 돌아온 이후 지방근무를 자원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의 실무 능력이 다져지게 됩니다. 그는 태자당 출신답지 않게 자원해서 지방근무로 감으로써 반감을 가지고 있던 관료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 그가 보수와 개혁파 양쪽의 지지를 얻어내기 쉽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키워드는 마오쩌둥의 '건국', 덩샤오핑의 '개혁', 장쩌민의 '발전', 후진타오의 '조화'였습니다. 시진핑은 첫 번째 키워드로 '민'을 잡았습니다. 그는 '당간부는 인민에게 복무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본주의를 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총서기는 관료의 부패를 막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정부 비판을 완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유온'으로 사회안정과 경제안정을 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이제 10 년 간 거대한 중국을 책임져야 하는 시진핑. 하지만 시 총서기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후 주석 집권 전반기 10~14%에 이르렀던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올해 7.5% 전후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빈부·지역·도농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군중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은 시총서기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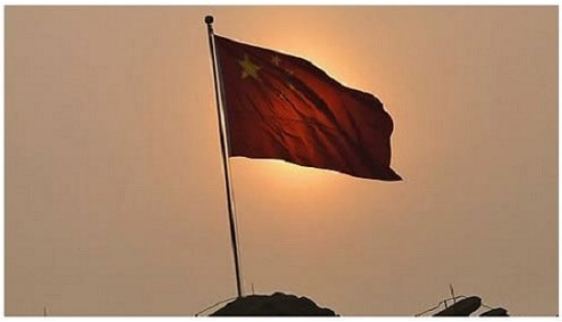
당장은 소득 분배 개혁을 통해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안정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찬룽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집권 후 2~3 년 간은 국내 개혁에 매달릴 것"이라면서 "가장 큰 초점은 어떻게 소득 하위 계층인 근로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응방안은?

'오바마-시진핑 시대'에는 한국의 전략과 역할이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미·중 양국이 협력과 경쟁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정부와 민간의 대응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정권 출범때는 중국과의 협조노선을 택했습니다. 아시아순방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서의 연설에서 '중국을 봉쇄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고, 현실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9 년 11 월 17 일에는 '공동 과제에 대처하는 21 세기의 파트너십 관계'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여에서 억제로 노선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라마 14 세와 회담한 것을 시작으로 강경과 관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들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감과 동시에 국제적 외교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 미국과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중 FTA 를 조속히 마무리하며 양국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국제 관계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에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거대한 코끼리입니다. 후진타오의 조화 정책을 시진핑 총서기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온순한 코끼리도 그의 안보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난폭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열강 사이에서 택해야 했던 역사적 선택에 또다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두 강국이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무너져버렸던 우리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 한국은 여우 같은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④ 김화랑(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패권(Hegemony): 개인 또는 한 집단에 의한 통치 또는 지배

지구에 생명체가 생겨난 이후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자신의 생존과 개체의 번식을 위한 패권경쟁을 일삼았다. 지구의 생명체 중 가장 높은 사고력을 가진 인류 또한 패권경쟁을 하였다. 그런데 인류는 인류가 아닌 다른 생명체들과는 달리 이들은 문화라는 것을 창조해내었고 이 틀 안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이 건국되었고 이들 간의 마찰에서 패권경쟁이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민족, 국가, 종교 등 이들 간의 다름으로 인해 전쟁을 하여 상대를 흡수하거나 또는 말살시키거나 또는 식민지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권경쟁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채 100 년도 되지 않은 국제연합이 생겨남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금지되나 경제적, 문화적 패권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즉, 지금은 모습만 바뀌었을 뿐 패권경쟁이라는 본질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인류사는 곧 정복의 역사였고, 100 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계가 혼란의 시기였다. 이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국제적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요즘 국제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영토분쟁이다. 이는 이 글의 제목처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작고 큰 분쟁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아는 우리가 속해있는 지역이므로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이 힘을 가진 나라들과 우리나라와 현재 대치상태인 북한 사이에 있기에 잘못 대처했다가는 국제적으로 매우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나 독도의 경우는 현재 국제재판소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제재판소가 1945 년 이후 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에 내린 판결로는 타이-캄보디아 사이에 벌어진 프레아 비히어 사원 사건(1962 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시파탄 섬 사건(2002 년),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페드라 브랑카 섬 사건(2008 년) 등 세 개가 있었다.



그 예로 2003 년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문제로 일본이 중국에 개발중지를 요구한 후로 서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2008 년 협정에 나섰으나, 결국 2010 년 9 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근처에서 일본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면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때 중국은 휴대전화, 컴퓨터 등과 같은 공산품에 꼭 필요한 자원인 희토류 원소 수출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일본이 사실상 항복을 하게끔 하였다.



“독도는 우리땅!”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2012 년 8 월 15 일 광복절을 맞아 정부에서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최근 바로 대내외적으로 큰 이슈였던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확고하게 발표하고, 독도 방문 이후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유감이고 한국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일본 내에서도 반한(反韓)감정이 크게 짙게 나타났다. 특히 이 사건으로 한국에 우호적이었던 일본 내 좌파세력의 반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도방문으로 인해 현재 일본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둘러싼 영유권 다툼이 한·중·러 3 국과 일본의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념에 따른 전통적 의미의 안보질서 붕괴까지 이어지지 않겠지만 국익을 위한 ‘한국·중국·러시아 대 일본’의 새로운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8 월 14 일 일본과의 영토 분쟁지역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전함 두 척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이들 전함은 예정대로 8 월 25 일부터 9 월 17 일까지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섬과 이투룹(일본명 에토로후)섬 등 쿠릴열도를 돌았다. 이에는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숨진 옛 소련의 장병을 추모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 그 아래 쿠릴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은 분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마저 공세로 돌아섰었다. 일본과 중국이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홍콩 시위대가 상륙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홍콩 시민단체의 댜오위다오 상륙에 맞대응 해 일본 우익인사 10 명 상륙한 것에 대해 중국중국 외교당국뿐만 아니라 중국 군부 인사까지 나서서 댜오위다오의 주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내에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상점이나 음식점에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매우 좋지 않은 상황까지 일어날 정도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밑바닥으로 치닫았다. 일본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져있다.

각 사안마다 대응하는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한다는 것도 일본 정부의 고민이다. 각각 한국과 러시아가 독도와 쿠릴열도에 대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센카쿠는 반대로 일본의 영토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 어떻게든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독도나 쿠릴열도와는 달리 센카쿠열도는 시끄러워질수록 일본측의 손해라는 입장이다.즉 공수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지도에 독도가 우리땅으로 나와있다는 사실이 국제재판소에서 힘을 못 쓴다는 견해가 일반적인 만큼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한편으로 국력을 키우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독도는 지켜야 할 우리땅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다.**

⑤ 나민아(전남대학교 경영학부)

몇 주 전 오바마의 재선 소식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몇 일 전엔 G2 국가인 중국에서 새 지도자 시진핑이 집권하며 세계 경제를 이끈다고 할 수 있는 두 국가에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동북아 정세와 안보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2기 미국 한반도 정책

- 북, 비핵화 또는 고립 중 '양자택일' 해야 ('대화' '6자회담' 단어 삭제)
- 북 핵무기·핵물질 이전시 책임 추궁할 것
- 북 도발 억제 위해 한·일 주둔 미군 유지
- 아시아 우선주의에 따른 주변국 동맹 강화
-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해 중국과 파트너 가능

※민주당 정강정책 참조.

우선 오바마 정부의 '2 기 국가안보'에 대해 살펴 보면 1 기에서 실행해 왔던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이에 새로운 외교전략을 덧붙여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을 제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외교전략이란 중국과 북한을 목표로 정하여 G2 국가로 계속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을 경계와 동시에 서로 개방하고 핵무기로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는 북한에게는 협박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는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북한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말을 은연중에 내뱉은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아직 구체적인 외교정책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 체제로 권력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중국의 기본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북한, 미국, 일본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등의 변화 요인이 생긴 만큼 그에 맞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진타오가 외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시진핑은 반대로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꾀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한 학자는 "시진핑 정권이 북한 정권을 안정시키고 개혁개방으로 유도해 정상국가로 만든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중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는 만큼 중국은 북한의 국제협력체제 편입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면 역작용으로 한·중 관계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구요? 남북관계가 아직까진 호전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갈 지에 가장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한 신문에서 봤는데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한·미동맹은 결국 미국과 일본의 중국 압박과 봉쇄에 가세할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게 중국의 우려라고 하더군요. 또한 중국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인가 봅니다. 가뜩이나 일본과 영토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한·미·일 세 국가가 중국 봉쇄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의 경우 많은 국가들은 또한 일본 정치계조차 "일본은 동북아 외교정책에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는 영토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대책 없는 외교 때문에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했죠.

한국의 국가안보(외교)정책은 어떨까요? MB 정권이 끝을 향해가고 있는 지금, 근 5 년 간의 외교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외교는 없고 충돌만 있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현재 우리는 곧 실시될 대선을 통해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어떤 안보정책을 펼칠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한국,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미국까지 정권은 바뀌어 외교정책이 변화되어도 동북아 정세에서 만큼은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크게 이 다섯 나라는 서로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조그마한 정책 변화가 다른 나라에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특히 요즘 같이 새로운 정권으로 바뀌는 시점에선 많은 혼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익만 챙기려 하지 말고 타협을 위해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 등을 통해 모든 국가의 협력을 꾀해야 합니다.

⑥ 민숙희(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지금 곳곳에서 새로운 정권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북한의 17 년만의 정권교체, 미국 오바마의 재선뿐 아니라 10 년 동안의 후진타오 정권이 막을 내리고 얼마 전,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한반도는 이런 급변하는 정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시아 시대의 개막



2010 년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P 총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아가 세계인구의 60%, 세계 GDP 의 26%, 세계 외환 보유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잠재성이 뛰어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로 미래학자 John Naisbitt 의 저서 ‘Mega trends’에 “21 세기의 거대한 물결 중 하나의 세계경제 및 문화의 중심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G2, 경제 거인 중국



미국과 함께 G2 를 이루고 있는 나라인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어 경제 거인이라고도 불리는 데요. 중국은 지난 10 년에 걸쳐 계속해서 전년 대비 연평균 9% 전후를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중국의 위상 또한 높아졌고요. 80 년대 외형적인 성장의 모습만 보이던

중국이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2001 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시 회원국 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관세를 감면받는 등의 특혜를 누리며 몇 년 사이 자본주의 대국 수준으로 급성장을 이루었고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 위의 수입시장이라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중 수교 20 년



올해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교 20 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92 년 8 월 24 일 한중 수교를 맺은 후 양국의 무역, 교류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하는 국가 중 92 년 대비 34.6 배 증가하여 미국, 일본을 제치고 최대 규모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제 2 의 수입대상국이 되었고요.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세계 무역수지 규모가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는 반면, 대중국 무역수지는 꾸준한 성장을 보입니다. 실제로 대세계 무역수지를 113%정도 초과하여 2,396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는 많은 흑자를 얻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성장할 것입니다. 중국의 GDP 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 년 17%, 2060 년 28%로 급상승하는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23%, 1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고요. 현재 중국의 1 인당 평균소득은 미국의 16% 정도인데요. 2060 년이 되면 중국 1 인당 평균소득이 7 배로 증가해 선진국 수준의 60%에 달할 것이며, 중국과 인도 양국의 GDP 합이 OECD 34 개 회원국의 GDP 를 합산한 것보다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13 억의 새 지도자,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탄생을 알린 마오쩌둥. 경제성장을 이끈 덩샤오핑, 미국과 중국,'G2 '시대의 문을 연 장쩌민과 지난 10 년간 중국을 이끈 후진타오. 그리고 몇 일 전, 5 세대 지도자 시진핑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분명한 것은 시진핑 시대가 와도 우리나라와의 교류와 협력은 발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수교 20 년 만에 교역 액 2 천 2 백억 달러를 달성했기 때문이죠.

또한 발전되어야 할 부분은 투자 부문인데요.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2 번째 투자대상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해외직접투자는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율은 증가세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하는 투자는 0.2%에 불과하다고 하니깐요. 우리나라의 높은 중국수출의존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중국경제가 침체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긴밀한 만큼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에도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한 대선후보는 "한반도 문제는 강대국 외교와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하신 적이 있는데요.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한중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⑦ 유선미(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급변하는 동북아 경제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북한과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우리에게는 통일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스스로도 예상할 수 없었던 통일을 거머쥔 것은 기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독일통일은 북한 급변사태 이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독에 자유선거를 통한 지도부를 만들어 통일협상을 이끄는 일체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한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나라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1.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를 보호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을 공개 시사화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줌으로써 통일된 한국이 탈북자 문제뿐 아니라 통일로 인한 모든 문제를 주변국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독일이 기본법 제 116 조에 따라 모든 동독 탈출자들을 수용하고 보호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확보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2.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 급변사태 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북한의 안정은 대량파괴무기의 안정적 처리, 비상식량계획 수립, 대량탈북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핵,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를 주도적으로 처리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핵 확산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유사시 2,300 만 명의 북한주민들에게 공급할 비상식량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북한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대량탈출을 막기 위해서는 과도기를 설정해 국경통제를 단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가 지도부를 선출토록 한다.
민주정권 수립은 몰락하게 될 공산권력의 반발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1989 년 11 월 9 일 베를린장벽이 해체된 후 서독의 콜 총리는 힘을 잃어가는 동독정권으로 하여금 자유선거를 통한 지도부 선출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1990 년 3 월 18 일, 역사상 최초의 자유선거가 동독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선거 결과 반공산당 드메지어(Lothar de Maisiere) 정권이 수립되었다. 콜 정부는 드메지어 정권과 통일협상을 추진해 통일조약을 체결했다.

4. 통일외교의 활성화이다.



독일의 통일외교는 서독정부의 외교적 결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통일의 기회를 역사적 당위성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외교전략을 밀어붙였습니다. 동독의 급변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전통 우방인 미국과 모든 과정을 논의해 나가며 미국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 문제는 독일민족의 자율에 맡긴다는 의견에 미·소가 동의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을 외교적으로 공략해 불가능할 것 같았던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 가장 큰 장애세력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은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토대로 통일의 자신감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통일비용도 독일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면밀히 조사 분석한다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⑧ 윤보라(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냐?” 뉴스를 보던 친구가 말했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논쟁’을 넘어 ‘분쟁’으로 확대돼 센카쿠에 일본의 경비정과 중국의 경비정에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본 우려의 목소리였다.

“설마 전쟁으로까지 번지겠어..” 나는 ‘애니팡’을 하던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뉴스로 시선을 돌리며 답했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분쟁(중국명 댜오위다오)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도 분쟁처럼 ‘논쟁’으로 그치는 싸움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건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중국 칭따오에 위치한 도요타 자동차 판매 1호점의 방화 소식을 전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는 아노미 상태에 놓인 중국 현지의 모습을 사색이 된 채 지켜봤다. 진심으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9월, 센카쿠 열도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직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전쟁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다. 나는 중국과 일본의 전쟁을 우려하던 친구의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 아니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전쟁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

생각해보면, 이런 우려의 질문을 들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내 주변에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한국인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던 그 친구에게서도 똑같은 질문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을 기억하는가? 민간인 2명 사망, 해병대 장병 2명 사망 이라는 비극의 결과를 낳았던 참사. 당시 21살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나는, 외국인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야 어떡해!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냐? 너무 무섭다"
"야 걱정하지마 전쟁 안나~"

수화기 너머로 전해오는 친구의 목소리는 흡사 울먹임에 가까웠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발했던 시기에 그녀의 남자친구는 군대에 갓 입대한 이등병 신세였기 때문이다. 외국인인 그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남북전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북한의 포격에 격한 분노를 표할 뿐, 전쟁이 두려워 덜덜 떠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적었다. 당사자들은 초연한데 비해 외국인들은 울먹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의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은 '휴전 중'인 국가다. 즉 언제나 전쟁 위험성을 안고 있는 위험한 국가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보는 한국은 '꽤 안전한' 국가이다. 휴전국이라는 사실은 변함 없지만, 우리 중 대다수는 '그래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외국인은 한반도 전쟁을 걱정하지만, 오히려 한국인은 태연한 상황. 생각의 차이가 만들어 낸 어이없는 촌극이었다.

우리는 모두 '걱정'을 안고 산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동북아 내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중일 분쟁, 남북 분쟁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영토 소유권과 과거사 사과 및 보상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역시 역사 왜곡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도 말할 것 없이 치열한 신경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내 높아진 반일감정이 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보며 했던 한국인 친구의 걱정과, 북한의 기습공격을 지켜보는 미국인 친구의 걱정. 이런 우려의 목소리 역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함을 증명하고 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한국은 어떤 대응전략을 취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한국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G2로 급부상한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살펴본 본 토론회에서 평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폭력시위와 우기기, 그 칼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서로 날을 세우고 대립하는 현재를 넘어서야 한다. 과거 역사적 잘못을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말이 아니다. 문제를 다룰 때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폭력으로 해결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이제는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

반일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일본기업과 일본계 슈퍼에 방화와 폭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보며, 이 문제는 중일 문제를 넘어 동북아 문제로 번질 것이라는 위험을 감지했다. 분노를 폭력으로 해소하려는 중국의 태도, 그리고 국가적 분쟁에 대해 우기기와 도발적 발언으로 대응하는 일본의 태도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분쟁에서 일본은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보이는 태도와 마찬가지고 '우기기'자세를 보이고 있다. 독도를 주제로 한 행사를 진행하고, 독도 방문을 계획하는 등 도발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중국은 어떤가? 중국 내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의 집단적 폭력이 우리나라로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너무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쳤던 까닭에 북한 지도부의 방만함을 부추겼고, '퍼주기' 외교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현 MB정의 각을 세운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가져왔다.

‘걱정’의 벽을 넘어 대화의 장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의 인물과 대화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동북아 긴장 상태를 해소하려면 인적 교류와 다자간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





성신여대학생들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북아 각 국의 리더들이 상시 대화할 수 있는 대화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대화를 통해 대립의 양상을 최소화 하고, 협력을 이끌어 낸다면 세계의 중심을 동북아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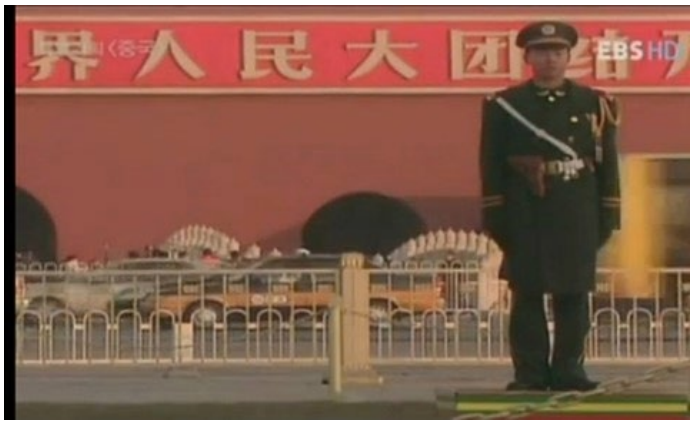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중국의 급부상이 있다. G2로 자리매김 한 중국이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인 강대국이 아니다. 미국이 혼자만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럴 때 일수록 한국은 한미동맹에만 연연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영리한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 중국과 손을 잡고 작게는 한-중-일의 대화를 주도하는 것도 국익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차기 대통령은 동북아의 불안정이 가져오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동북아 대화의 장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뛰어난 용병술로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해 동북아 문제를 ‘인물 외교’로 해결하는 유연함도 가져야 할 것이다.

돌고래의 날렵함과 유연함을 보여줘!

2012년,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20년이 되는 해이고, 일본과 중국이 수교한지는 40년이 되는 해이다. 수교의 시간이 수십 년이 되어가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긴장과 걱정 속에서 지내야 하는가? 세계 패권이라는 '고래'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돌고래'로 성장했다. 지금은 작지만 날렵하게 헤엄치는 '돌고래'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외교전략이 마련돼야 할 때이다.

⑨ 장민영(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최근 중국은 세계 경제력 2 위에 오를 만큼 크게 부상했습니다. 미국도 이를 인정하며 중국에 대해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진행하는 중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신냉전체제가 오지는 않을까 걱정도 하지만, 상호 이익이 얽혀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급격한 안보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철수가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체제가 더 굳건해져가고, 북한은 권력 세습으로 인해 불안불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 학과장 유호열 교수님께서는 월례토론회에서 이번 대선후보들이 너무나 용기없는 공약들만 내세우고 있다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대북정책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향으로 잡아놔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너도나도 눈치보기 급급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 눈치, 미국 눈치, 북한 눈치 게다가 국민들의 눈치까지 봐야 되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얼마 전 **동국대 북한학과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연합 포럼**이 있었습니다. 각기 대북정책에 대해 발제하고 미래의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국대와 고려대가 생각하는 대북정책 차이와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생각도 북핵에 대한 생각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게다가 안보관을 정립해야 하는 20 대가 얼마나 안보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NLL 에 대해서 제대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와의 분쟁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북한과의 분쟁은 전쟁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우선시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평화로운 시각에서만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시치미를 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핑계가 NLL 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논쟁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1 차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최근에는 열띤 토론이 열리기도 했었죠.

NLL 은 1999 년 UN 사에서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 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다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총비서로 3 대 세습이 고착화되면서, 새로운 권력구조와 당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리영호의 해임으로 인해 얼마나 북한의 권력체계가 혼란스러운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리영호의 해임은 단순한 고위층 바꾸기의 권력 변화가 아니라, 장성택-김경희의 권력과 맞물려 북한체제의 혼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좀 더 중국에 의존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 역시 새로운 시진핑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세계 속에서 대립보다는 함께 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시아오허 청 중국 인민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시진핑 부주석의 한반도 정책방향을 예측하였습니다. *「시진핑 부주석이 볼 때 한반도의 전략적 입장은 후진타오 시대만큼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전반적인 중일 관계가 센카쿠 분쟁 때문에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이 지역의 주요 국가 간의 관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진다. 영토 분쟁을 오래 끌수록, 곧 이 지역의 다른 문제를 파생할 수도 있다. 분명, 중일관계와 중미 관계가 계속 악화된다면, 중국이 예상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이 경제 개혁의 길에 들어섰고 남한 정권이 교체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줄어들 것이다. 한반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사건 대응형 외교 정책 상 한반도에 대해 관심을 덜 갖게 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 이 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쇠퇴,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미리 대비하고 우리 정부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가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동북아 힘의 균형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관계 사이에서 북한문제까지 짊어진 우리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2013 년은 한·미·중·일 4 국에서 리더십이 새롭게 시작된다. 미·중간 대립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하며 한·미·중 협력관계를 열어나갈 외교 전략은 무엇인가. 대선후보들은 치열하게 고민해 그 밑그림을 내놓아야 한다. 」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려면 중국, 미국만큼 강대국이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굳건한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후보도 내놓기 어려운 게 우리의 대북정책과 외교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해결책을 내 놓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언젠가는 멋진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격변하는 역사 속에 스펙과 취업에만 목매는 20 대로 흘러가지 말고 더 넓게 보며 주체적인 역사를 사는 20 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⑩ 정해경(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지난 10 월 25 일에 열린 제 69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점차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한국외교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많은 논제들이 다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과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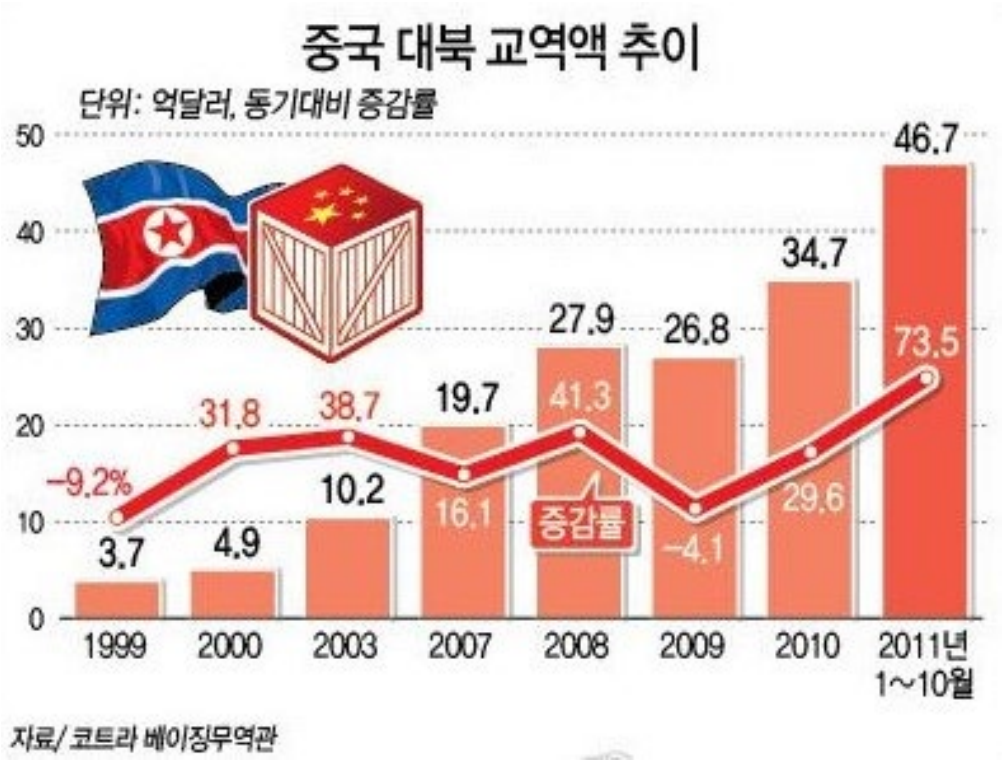
2012 년의 막바지에 다다른 요즘, 방송과 인터넷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12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것입니다. 각 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갖가지 공약을 내세우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약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편적·선택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정책의 초점을 복지로 이동시켰고, 경제민주화라는 것 역시, 박근혜 후보는 국민통합을, 문재인 후보는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제와 복지에 관한 공약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가려져 크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통일의 당위성부터 시작하여 어떤 식으로 통일을 이뤄야 하는지 등의 방법론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통일의 문제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여러분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통일에 대한 관심은 다른 것들에 의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과 여전히 핵무기를 앞세우며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북한의 모습을 통해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통일'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북원조는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8 년 식량과 비료를 포함한 물자 원조를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2004 년 북·중 교역은 급증추세를 보여 2010 년에는 34 억 6 천만 달러, 2011 년은 56 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인 영향력이 커질수록,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도 커지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교역량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증대되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의 중심에 서있는 중국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약 혹은 군사적 협약 등의 단기적인 해결방안은 물론 북한과의 통일을 통한 장기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북한과의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어려움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통일은 우리 국가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한 번 넘어야 할 고비라면, 조금 더 비중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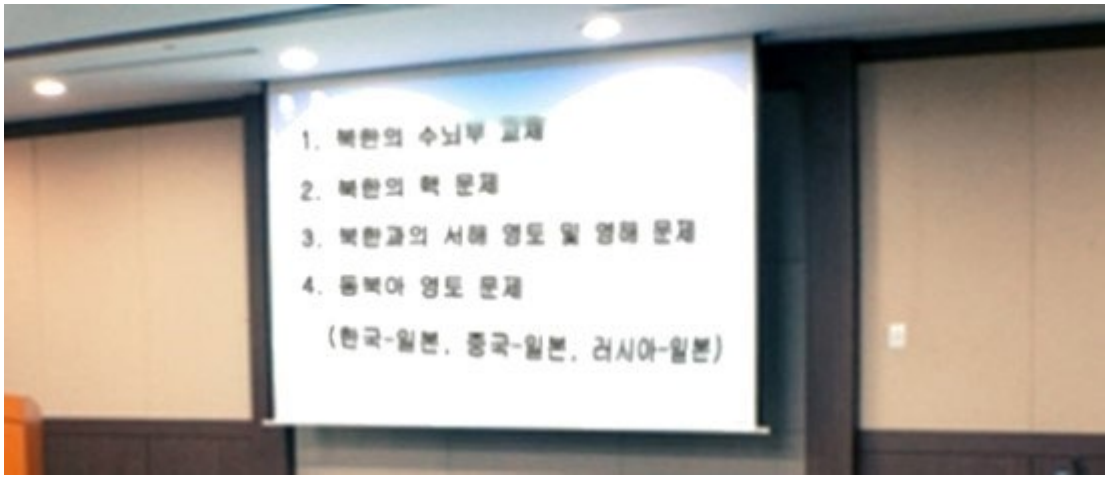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벌써 가을이 다 지나고 서울에는 엊그제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온은 점점 내려가고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대외 정세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모여 뜨거운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이라 학기 내내 과제, 보고서 그리고 시험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소주제와 토론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2012 년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는 과학의 발전 속도 만큼이나 급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탈냉전시대라고 불리던 90 년대 초 이후의 국제 그리고 동북아의 정세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미국 패권주의가 도래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동북아시아에서는 버블붕괴로 인한 일본의 경제위기와 문을 개방한지 채 2~30 년도 되지 않은 중국의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등의 몇 차례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국제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약 20 년 동안 한국은 북한과의 수 차례 마찰이 있었으며, 북한은 작년 김정일 사망 이후 세계적으로 대륙에 붙어있는 섬 수준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경제 침체와 고령화,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부상, 북한의 지도부 교체와 핵무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5 년, 10 년, 20 년을 준비하고 선진국이 되는 방향으로 잘 대처하고 걸어나가야 합니다. 즉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의 문제를 잘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찰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69 차 월례토론회 주제인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하여 토론을 진행하였고, 동북아 정세를 군사, 경제, 정치, 외교 등의 여러 작은 분야로 또 나누어 군사와 영유권 부분에 중점을 두어, 특히 북한의 수뇌부가 바뀐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전략과 더 멀리 바라보아 통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 토론 주제 및 내용 〉

[토론 전문]

김화랑: 안녕하십니까?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 사회자, 김화랑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연구모임의 주제는 지난 69 차 월례토론회 주제였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입니다. 여러 토론자들께서 저번 토론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공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라 어렵고 생소하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조사 및 현 상황들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을 토대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중 '군사 및 영유권' 분야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부는 대선으로 매우 뜨겁습니다만, 불과 1 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은 수뇌부가 교체되었고, 한두 달 전에는 일본과 다른 나라들 간의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 병사가 철책을 뚫고 우리나라 부대에 도착하여 노크 귀순한 사건이 있었지요. 최근 20 년 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일본과 중국의 견제로 항상 주의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 현 상황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우제: 동북아 정세가 매우 급변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북한에서 무엇을 했다', '일본과 중국이 어떤 일을 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동북아 인접 국가들의 상황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해외사업과 같은 경제분야, 기술발전과 같은 이공분야 그리고 연예, 음악, 영화와 같은 문화산업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달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맞아 동북아도 물론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상황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조근우: 저는 먼저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 국가이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의 70 년에 가까운 기간을 분단국가로 지내다 보니 경제적, 문화적인 삶에서 엄청나게 큰 격차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장우제 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한 나라의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것을 지키고 상황에 맞춰 발전해나가기만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기에 끌고 가야 하는 과제가 있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도 알다시피 북한은 앞으로 우리와 통일해야 할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들의 주장에도 논리가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고 어떤 부분으로 보나 통일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정말 부국강병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상: 저도 통일에 당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남북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모두 찬성하시나요?

토론자 전원: (당연히) 찬성합니다.

강민상: 앞서 조근욱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하여 생각하여 볼 때 분단된 이후로 북한의 수십, 수백 차례의 군사적, 정치적 도발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처방식을 잘 생각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5 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전략이 바뀌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15 년을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햇볕정책을 택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도 어느 정도 바통을 이어받아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지녔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 매우 북한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 처신하였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북한에게 햇볕정책 식으로 나갔지만 그 당시에도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일으켰으며 연평해전에서 우리나라 장병이 목숨을 잃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은 잘해주어 봤자 우리나라에게서 이를 취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행동만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북한에게 어느 정도는 강하게 나가야 하는 현재의 전략은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영보: 저도 이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시 되는 세력 중 하나가 바로 종북 세력인데요. 친북을 넘어서서 북한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기에 한국에서 특히 청년 층에서 북한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NLL 에 대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이번 토론에 대해 자료 조사를 하시면서 자세히 아셨을 것이고 물론 그 전에도 아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됩니다만, NLL 은 Northern Limit Line 의 줄임 말로 북방한계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왜 NLL 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느냐 하면,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16 대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최근 변희재-진중권 사망유희 토론에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이러한 점이 다루어졌나 다루어지지 않았나, 다루어졌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NLL 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토론 모습 〉

김화랑: 잠시만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NLL 이란, 사전적 정의로는 '1953 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인데, 정전 후에 북한과 육상경계선은 설정을 하였으나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아 일단 우리나라 쪽에서 NLL 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시 북한에 통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 후 1972 년까지는 북한도 NLL 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으나 이후 갑자기 서해 5 개 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주변 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법 학자들은 NLL 을 설정하는 것이 영해를 규정짓지 못한다는 식으로 견해를 내보였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 확고하게 NLL 이 존재하므로 우리 수역이고 이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적으로 NLL 근처에서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고,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격과 같은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한영보님께서 계속 발언하시겠습니다.

한영보: 최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가 논란이 되어 현재 대선 정국에 최대 이슈 중 하나이다 보니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NLL 은 지켜야 할 대상이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NLL 을 포기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였으니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무현을 따라 그의 뜻을 이어 받겠다는 목소리의 문재인 후보에게서 NLL 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기에 이 정도까지 발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주장은 NLL 은 당연히 지켜야 할 대상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일을 해나가야 할 대상이지만 현재 북한에 대해 끌어 안을 수 없다면 일단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화랑: 사실 토론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토론자들이 공감하는 바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미경 토론자께서 동북아 국제 정세에 대한 한국의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주시겠습니다.

임미경: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예전 김대중 대통령 시기부터 북한과의 정말 대화합적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북한은 햇볕정책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토론 중에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북한이 잘하든 못하든 햇빛을 내리 쬐어 주듯이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면,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통일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덜 되게끔 하고 그들이 개방 정책을 펼칠 것이며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도와줌은 도와주는 대로 받고,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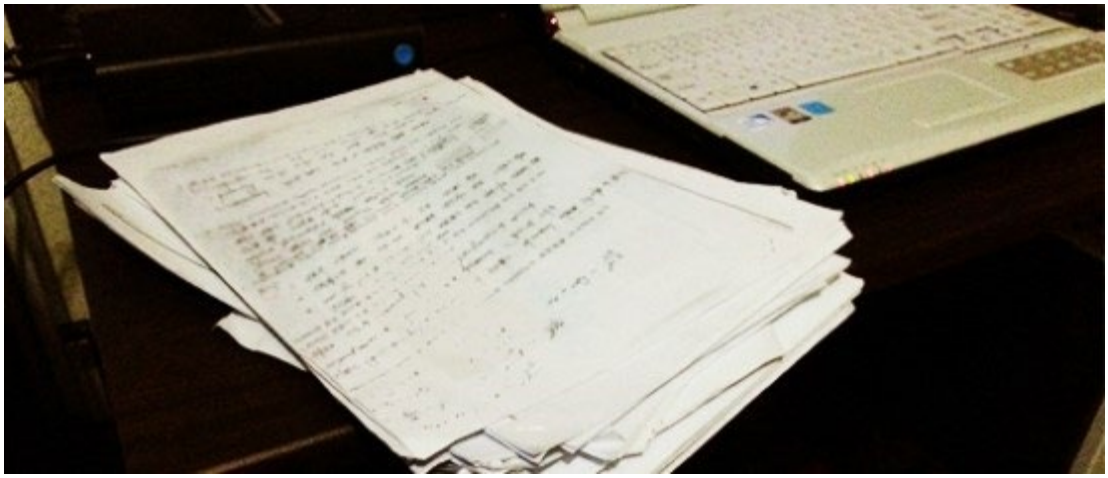
장우제: 저도 어느 정도 그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학기에 '한국 정치의 분석과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은 발상은 매우 좋았으나 그것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정책이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북한이 이미 햇볕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이죠. 즉 역이용당해버린 건데요. 이게 매우 간단한 논리인데, 잘 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나쁜 짓을 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어야 합니다. 첨언이지만 못한다고 해서 벌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북한은 잘 하는 자도 못하는 자도 아닌 나쁜 짓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하든 잘못하든 난 네 편이야.'라며 상을 줍니다. 물론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는 잘해서 주었다 이런 것이 아니겠지만 편의상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여기서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북한은 이 상황입니다. '내가 군사적 도발 안 할 테니까 돈 내놔.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면 또 배신을 하는 거죠. 속된 말로 하면 좋은 거 해주니까 뒤통수를 치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도 임미경 토론자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라: 저는 어느 정도 햇볕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잘못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햇볕정책이 조금 수정되어 실행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면 이 정도의 혜택을 주고 어느 정도 감시를 잘 할 수 있다면 너무 강경하게 나가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사실 북한에 대해 국민들이 악감을 가지게 되면, 현재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도 힘들고 나중에 통일을 해서도 많은 괴리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이 핵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고, 도움을 바란다면 핵 무기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시하고 관리하는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우정: 네, 저도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김영라 토론자께서 핵에 대해 말씀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착수한지 거의 20 년이 되갑니다. 물론 그들은 원자로 건설이라는 변명을 가지고 있었죠.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도 서명했었으나, 그들은

막무가내로 협정을 깨고 핵 개발을 시도하였고 미사일을 쏘아 올렸으며 핵 실험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매우 큰 일이긴 한데 많이 알아본 제 지식으로는 핵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지만, 북한이 정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한 핵 자체만으로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게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핵 개발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북한 수뇌부들은 권력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핵을 더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조근우: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사회 전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는 북한에서도 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일당독재체제에 자유와 소통이 허락되지 않는 나라에서 수뇌부들이 언론과 정보통신까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김정일 사망 이후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결국은 그의 아들을 추대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북한에서 매우 중대한 소식이라며 발표를 한 것이 바로 김정은이 원수 계급에 올라섰다는 것이었죠. 바로 그런 식으로 언론 통제를 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히 다지는 것인데요. 북한 수뇌부도 두 개의 파로 나뉘는데 바로 강경파와 온건파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최근 온건파의 주축이 숙청됨으로써 남북 간에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도록 한국에서 외교를 하고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토론을 위한 자료 조사 〉

김화랑: 이제 북한 외에 한국 주변 국가들인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서 토론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김희서: 가장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영토 분쟁이었지요. 일본의 계속적인 독도 야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처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에게서 매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 한 수가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 4 개 섬) 분쟁 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한동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당연히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현재 실효지배하고 있는 것으로도 한국령이라는 것을 미리 밝히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센카쿠열도는 일본령, 쿠릴열도는 러시아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겠지만 어느 정도 역사적인 이유와 현재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토대로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 분쟁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본에 대해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국제법을 토대로 재판소에 끌고 가보자는 식으로 하게 될 경우, 아직은

일본에 비해 약한 국력과 작은 경제규모를 지녔기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해: 저는 일본이든 다른 어떤 나라든 우리나라의 영토나 영해, 영공을 불법으로 점하거나 침하는 행위를 할 경우,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침착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어떤 차이인지요? 정확한 단어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희서: 저는 무기 사용은 매우 신중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불법으로 잠깐 들어왔다고 하여 무작정 쏘아대면 서로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고 또 국제적으로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우리의 권리가 침해 당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은 감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감정적인 행위라 함은 상대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킨다든지 상대 국가의 국기를 불태우고 찢어버린다든지 상대 국가의 이민자나 우리나라에 와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범행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화랑: 좋은 의견입니다. 침착하게 한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동일한 논리로 감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다른 사안에 대한 발언이나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영유권 분쟁에 대해 추가 발언하실 분 있으면 발표해주십시오.

노우정: 저는 독도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학창시절에는 '왜 한국은 이렇게 약하게 대처하기만 할까?',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 말을 못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배우고 또 찾아보고 나니 우리가 아직 국력이 강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분쟁이 일어나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에서야 왜 지금까지 이렇게 대처했는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것은 외국에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전쟁 성폭행 문제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널리 알려서 언젠가는 꼭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해: 옳은 의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경우는 참 드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참 안타까운데요. 용서, 화해 다 좋은 말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을 때야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일본을 보면 아직도 반성은 커녕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어려서부터 잘못된 교육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기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삼자가 보았을 때 독도가 한국땅인지 일본땅인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그리고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랑: 모두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을 들어보니 오늘 토론은 토론이라기 보다는 토의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선진 한국을 위한 국가관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얻는 지식도 소중하지만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국가의 향방에 대해 논하여 공유하는 지식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맺음말]

제 3 차 서울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는 토론 전 간단한 논의를 통해 동북아의 군사 및 영유권 문제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토론자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토론보다는 논의에 가까웠지만 앞으로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국가에 대해 더 올바른 가치관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점에서 다들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급변할뿐만 아니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침착하게 대처를 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잃지 않고 선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남북, 한일, 한중 간의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2 월 대선에서 결정되는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이 향후 5 년 간 한국이 지니게 될 외교적 방향은 앞으로 5 년, 10 년 더 나아가 100 년까지도 결정할 수 있기에 더욱더 신중하게 선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정의롭고 강한 나라가 되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번 달 월례토론회에서는 저희 학과장 교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동북아 정세와 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토론회에도 모시고 싶었지만 연예인보다 바쁘신 우리 교수님을 모시지 못한 채, 보다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북한학과로 구성된 토론모임을 가졌습니다. 중국과 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안보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북한문제와 북핵, 그리고 앞으로의 대북정책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장민영(북한 3) : 안녕하십니까. 제 3 차 고려대학교 연구모임 사회를 맡게 된 북한학과 10 학번 장민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보다 북한과의 문제를 논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너무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는 대선 후보 분들의 정책은 너무 애매하고 용기 없는 공약 뿐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김정은 정권으로 들어서는 북한 정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되야 하는지, 혹은 공약들에 대해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아영(북한 3) : 제가 어제 오바마랑 시진핑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특히 시진핑을 보니까 사람이 농촌지역의 부흥에 관심이 많고 그의 정치적 스승이 국방위원장이라 시진핑이 군사쪽에도 관심도 많고 지식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시진핑이 우리 남한을 배척하려고 하기 보다는 남한과 북한을 각각 다른 나라로 대하면서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하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나라한테는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적 요건들을 합의해 주고, 북한과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우호국가이다 보니 계속 우호적으로 갈거 같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했지만, 공산주의적인 정치적 성향을 한번에 싹 뒤바꿔 버리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시진핑도 이러한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남한은 시진핑과의 우호적 관계를 잘 이용해서 시진핑이 북한의 체제유지 장기화를 도와주려는 걸 막아야 할 거고, 무엇보다도 그런 연고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중국과의 경제력협력 강화? 이부분에 답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북한 2) : 일단은 추세가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너무 과도하게 중국과의 협력 체제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안보체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장민영(북한 3) : 북한을 고려해서라는 말은 중국보다 대북정책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시나요?

김동욱(북한 2) : 아무래도 대북정책 대안이 애매한 것은 사실인거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하니까 이런 정책들밖에 내놓지 못하는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차기 대북정책에서는 분명하게 중국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재욱(북한 3) : 대화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함으로써 기본합의서는 무효가 됐고,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 우리가 굳이 저자세로 대화장을 구걸하면서 나갈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분명 MB 대북정책보다는 세 후보 다 대화국면을 만들려는 큰 틀은 세우고 있으니까 분명히 어떻게든 대화의 장이 생길꺼고 이 때 대응방법이 중요한데 박근혜 후보자는 예전에 김정일을 만난 적도 있으니까 북한측에서 그렇게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임기 초기에는 상황이 어떻든 대화창구가 열릴 듯 싶은데 박근혜는 MB 와 차별성을 두는 데 항상 치중해 와서 낮은 단계의 개방을 전제로 개성공단 확대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싶어요.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때 대북정책을 짰던 인물들이 모두 문재인 선거캠프에 있어서 문재인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때로 돌아갈게 뻔해 보이기도 해요.

안철수는 백낙청등이랑 회동도 하는 걸로 봐서 2013 체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문재인⊠안철수 후보 둘 다 해당하는 거니깐 두 후보 다 당선되면 남북연방제 추진을 위한 기틀을

우선적으로 다지려고 노력하겠지만 이건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합의가 우선 돼야 하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민영(북한 3) : 남북기본합의서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 대원칙의 재확인, 민족화해 이룩,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의 번영 도모,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입니다. 또한 낮은 단계라는 언급이 나와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서는 워낙 논란이 많습니다. 낮은 단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언급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욱(북한 3) :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중국 미국 모두 지도부가 새 출발하기 때문에 비록 오바마 정부가 유지되고 있어서 미국은 그렇다 쳐도 중국은 친북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동북아 다자간 평화를 위해서 중국 눈치를 보게될 것 같아요. 그래도 중국의 입김에 휘둘리기 보다는 중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친북정권이 들어서면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강경하게 나올게 뻔하니까 우리나라도 나름의 원리원칙이 필요합니다.



전아영(북한 3) : 박근혜 후보자의 원리 원칙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도 애매해 보이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 자리이니 만큼 큰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세 후보 모두 차별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북정책을 놓고 이야기하다 보니 세 후보를 비교하게만 되는 것 같네요..ㅎㅎ 하지만 미래의 대북정책은 현 정세에 맞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욱(북한 3) : 대북정책이 애매해진 것은 박근혜 후보는 MB 정권이랑 나름대로 차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는데 당장에 대북정책이 압박효과를 거두고 있는 마당에 MB 식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기가 껄끄럽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자기들이 이루려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던 7.4 남북공동선언에 근거해서 대북정책을 세우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급진적인 정책안이 되어버리니까 선거 이전에 표심을 정확히 밝히기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민영(북한 3) : 네 그럼 잠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의 관계에 대해 의견이 더 있으신 거 같으니까 몇 분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우(북한 2) :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중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우호관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북중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중 우호관계는 한중 협력과 효과적인 정책 협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선후보들은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 있어 추상적이며, 뭉뜨그려 제시하는 측의 공략은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대북정책의 국제적인 협조와 외교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며 다각적인 각도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민(고고미술 4) : 맞아요. 유호열 교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정책안을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대북정책안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없는 듯 합니다. 북한학과 특성상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구상해 나가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도 물론 뒤돌아 봐야 하구요.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것을 이제는 우리나라가 외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중국 아웃! 중국-북한, 미국-우리나라의 신냉전시대가 오지는 않을까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윤지혜(북한 2) :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이 미국을 통해서 중국과의 교류를 이끌고 이로써 북⊠중 간의 교류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통미북남이라고 합니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일단 남한이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꾸준해야 효과도 있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교류를 중심으로 북한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협력관계가 되는 걸 북한도 두려워 할 거 같아요!

손주웅(생명공학 4) : 저는 북한문제에 대해 아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현 동북아 정세가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실제 북핵문제나 3 대 세습 등으로 북한은 현재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미.일 동맹 체제가 더 굳건해진 상태에서 혼자 따돌림을 당하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을 옹호하겠지만,

한미일 모두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과다하게 감싸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한다면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벌벌 떨게끔 생각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죠.

김준호(북한 3) : 기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선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실질적 효율성이 없는 불투명한 대북지원 또는 협력을 봉쇄하는 정책이었다는 관점에서 그 정책을 평가했을 때, 남북관계에 100% 효율적으로 작용했다고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서 내놓을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보다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또한 불투명하므로, 향후의 대북정책의 성격이 강경노선을 이어가야 할지, 유화노선으로 변화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다수의 국민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할 새 정부는 격변하고 있는 현재의 동북아시아 질서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옹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정부는 최근 그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대남도발 방지와 한반도 평화확보를 위한, 양국 모두에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나, 한반도 내 남북한 문제와 나아가 통일문제까지 중국의 입장과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의 오랜 혈맹관계와 지리적 인접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한반도 내 여러 문제와 통일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소신 있는 정책을 새 정부는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은영(북한 2) : 저도 먼저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 북한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발판을 마련하면 경제협력 같이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시작해서 교류를 확대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북한이 강하게 거부하고 단절하는 상황이니 중국과 삼국이 함께 협력하면서 대북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네요.



장민영(북한 3) : 네. 오늘은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을 한 것 같아요. 북한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주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토론을 하니까 더 재밌고 배우는 것 같네요! 2013 년은 부상하는 중국과 우리나라 북한 그리고 미국의 관계로 혼란과 변화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게 안보인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가 발전하는 한반도 정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제가 제일 맘에 들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③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강소라: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을 내어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토론할 주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인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도서관 정문에 비치되어있는 경제신문입니다. 운 좋게도, 오늘 토론할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토론하기 전 여러분과 잠깐 신문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페이지입니다.

다들 읽으셨나요? 기사에 대해 짤막하게 정리를 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대선에서 시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 기사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하며 동북아 정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3 번째 문단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은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문제 해결능력도 중요하다. 설상가상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힘 겨루기, 영토분쟁 등 동북아시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 속에 유력 대선후보들과 정당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외교·안보 및 통일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1 세기는 아시아·태평양 시대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전략과 중국의 급부상, 러시아의 동진정책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에 힘의 균형이 재편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새로운 리더들이 탄생하는 해다. 내년에는 새로운 리더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특히, 미국과 중국 주도의 동북아 신질서 구축에 기선싸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5 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대통령의 외교·안보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뽑아야 할 대통령의 자격요건 중 하나는 동북아 정세를 좋게 유지하는 대통령이여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읽은 기사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월례토론회를 보고 느끼신 점, 또 찾아보셨던 자료를 토대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덧붙여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자신의 학과소개와 함께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저는 사회복지학과 김지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북한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일일이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북한의 생활은 정말 우리나라의 노숙자만도 못합니다.



앞서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통령후보들은 지금 복지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남한만의 복지가 아니라 북한까지의 복지라고 생각해요. 현재 북한은 정권지도자가 교체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긴장상태가 고조되었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나라도 정권교체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토론문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한반도 통일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소라: 지영씨는 왜 통일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지영: 북한에는 아직 잠재적인 자원이 아주 많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기술이 발전할대로 발전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이 합쳐지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한반도는 해안과 대륙을 이어주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남한이 단절되어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외교 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소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영씨의 주장과 같다면 어떻게 한반도 통일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혹시 반대하시는 분은 안계신가요?

유지선: 저는 행정학과 유지선입니다. 저는 지영씨의 주장과 같은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서독과 동독이 점진적인 교류와 접촉을 통해 안정적인 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통해 점진적인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남한과 북한만이 양면대립구조로는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둘러싼 세계강국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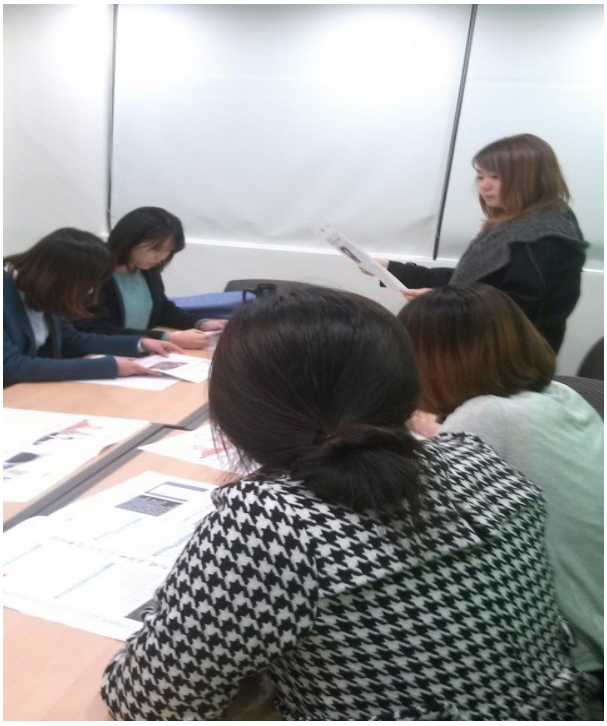
강소라: 그럼 지선씨는 세계강국들과의 대화를 통해 통일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시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서 유학하시다 온 보람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았던 뉴스에서 중국외교관이 말하길 중국이 협상하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중국과의 대화가 통할까요?

김보람: 저는 중어중문학과 김보람입니다. 저는 중국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예요. 북한이 대외적으로 가장 많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토론문 19 페이지를 보시면 중국 북한관계 긴밀화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북중교역은 급중추세를 보여 2011 년 56 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해요.

아까 질문하실 때, 중국과의 대화가 통할 것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본 기사에 의하면 중국은 재료, 가공, 농업 기술에서 한국보다 기술우위가 있고 한국은 철강, 정보통신기술 등에서 우위에 있어 FTA 가 맺어지면 양국 간 기술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자신들의 이익과 전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우리나라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북한과의 문제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박선영: 저는 컴퓨터학과 박선영입니다. 저는 중국과 일본관계를 말하고 싶어요. 일본이랑 중국은 지금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댜오위다오 국유화 이후 중·일간 갈등이 고조되었어요. 또 토론문에도 있듯이 해양영토분쟁도 있고요.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는 일본물건에 대한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불매운동이 일본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만큼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이니까 우리는 중국을 이용해서 일본에 타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보람: 선영씨, 그거는 도발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동북아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김지연: 저도 컴퓨터학과고요. 김지연입니다. 저도 선영씨랑 같은 생각이에요. 일본에 타격을 준다는게 뭐 전쟁을 하자 그런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파를 주자는 거에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일본의 정보수집력이 높아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이미 일본은 그 정보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부분만 조심한다면 약간의 타격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김지혜: 저는 경영학과 김지혜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압박 같은 걸 준다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괜찮은 전략이라고도 생각되네요.

박선영: 네, 제가 말한 것도 그냥 압박정도지 전쟁을 말한 건 아니에요.

강소라: 중국을 이용해서 일본에 압박을 주자는 전략은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본과 영토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는게 대한민국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랑 같은 의미는 아니니깐요.

여러분 현재 우리는 북한, 중국, 일본과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말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지선: 미국과의 관계도 우선 대선결과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롬니랑 오바마가 치열하게 선거유세를 벌이고 있으니깐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특성이 다르니까 전략도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김보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꼭 정권이 교체된다고 전략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방향은 유지하되 조금 수정하는게 대외전략 아닌가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략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면, 전략은 하루에도 수십 번은 바뀌어야 할걸요.

김지영: 저도 보람씨 생각에 동의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분명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겠지만 말이에요. 미국은 현재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했어요.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 중국을 분명하게 잠재적 적국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아까 주장하셨던 것처럼 중국을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자는 주장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땐, 어쩌면 미국을 견제하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예전에도 소련과의 대립구조가 돌아올까봐 긴장하고 있는데, 미국에 호의적인 우리나라조차 중국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유지선: 좀 불안한게, 토론문에서 봤는데 중국도 군사력 강화와 연성균형전략 동시 주변국 영향력 증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북한의 문제도 크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까지 올 것 같거든요.

강소라: 지영씨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지영: 우선은 미국과 중국의 국방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아까 진행자님이 나눠주신 기사에 나와 있듯이 미국과는 혈맹에 기초한 안보동맹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 강화와 유연한 외교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선영: 저도 그 기사의 주장에 동의해요. 미국과 안보동맹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무래도 경제하면 미국을 빼놓을 수 없으니깐요.

강소라: 그럼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동북아 정세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열띤 토론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④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최근 중국의 급성장과 동시에 정권교체, 또한 북한의 지도자 교체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각각의 국경으로 나누어진 개별적인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와 시장으로 통합된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흐름에 뒤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야 국제 사회에서의 중심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겠지요.

그 일환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 중국의 급성장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의 관계, 대북정책에 대해 명지대학교 학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서영(국어국문 3): 이번 주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입니다.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대학생 수준에서 가볍게 풀어나갔으면 해요. 그럼 먼저, 중국이 급성장하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지 이야기해봅시다.

월례토론회에서는 중국이랑 미국은 동반자 관계가 아닌 패권주의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동북아 지역 안에서 협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협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한미 FTA 등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중국은 기존의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다지면서 우리나라와도 한중 FTA 를 맺으려고 하는 등 관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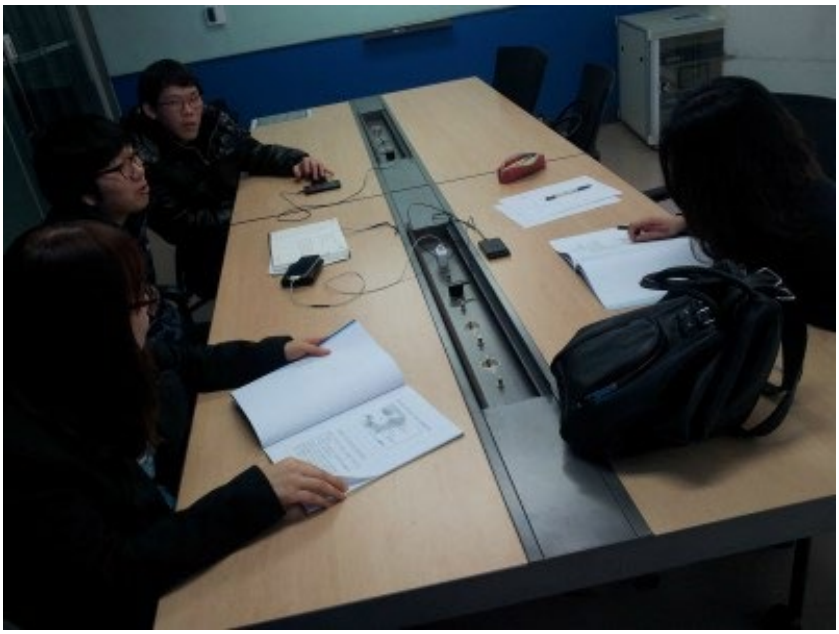
이한별(국어국문 4):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대주의 등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었지만, 현재는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요?

황규정(국어국문 4): 비우호적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보다 아래에 있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아요.

이한별(국어국문 4): 예를 들어 소위 'made in china'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생산된 저렴하고 질이 낮은 상품, 진품을 모방해서 만든 이미테이션 상품 등으로 인해 박힌 중국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황규정(국어국문 4):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상적으로 중국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경제를 개방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나라보다 발달이 되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 인구만 많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나라보다 하위에 두고 있는 시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국유학생을 보면 어쩐지 무시하는 듯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태도를 많이 보았어요. 결국 중국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중국에 대해 우위를 내포한다고 생각해요.



이한별(국어국문 4): 하지만 중국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이고, 그 부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들었어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서영(국어국문 3): 중국은 현재 외환보유고 1 위라고 해요.

이한별(국어국문 4):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대거 사들였다고 들었어요.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은 정치적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아무리 강대국으로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동북공정 등 역사적 갈등 문제까지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강하게 대응하되, 경제적으로는 수교를 맺는 등의 유연성 있는 정책을 펴야지요.

저희 부모님이 옷 공장을 운영하는데, 현재 중국 노동력의 인건비도 과거보다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고 해요. 또한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건설 산업에 주력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강남과 같이 일부 도시에 많은 인구가 몰리는 바람에 여러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가 많다고 해요.

즉,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지만, 중국은 워낙 많은 외화보유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 기존 강대국의 경제위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더욱 중국과 경제적인 수교를 계속해서 맺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서영(국어국문 3): 결국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선진화포럼에서 명사들과의 대화 시간에,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시장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급부상이 동북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한별(국어국문 4): 옛날에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듯이,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돈이 곧 힘이니까 외화와 자본을 많이 보유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즉, 중국이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김서영(국어국문 3):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중국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달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잖아요, 이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크더라고요. 일본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어서 일부 기사에서 일본과의 거래가 위축되었다는 내용을 보았어요.

일본과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있는 것처럼 중국과도 동북공정 등의 역사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하되 경제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맺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황규정(국어국문 4): 저도 그 부분에 의문이 들어요. 역사적으로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만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조금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한별(국어국문 4): 그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몫이라는 거에요. 월례토론회에서 말했듯이 그래서 차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황규정(국어국문 4): 아무리 정치인들의 몫에 달렸다고 하지만, 저희가 봐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더욱 힘들지 않을까요? 따라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 어떤 정책을 내세웠을 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 자체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중국의 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결국 중국이 지금 급부상하게 된 원동력에는 '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결국 중국 내에서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과연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을 지 의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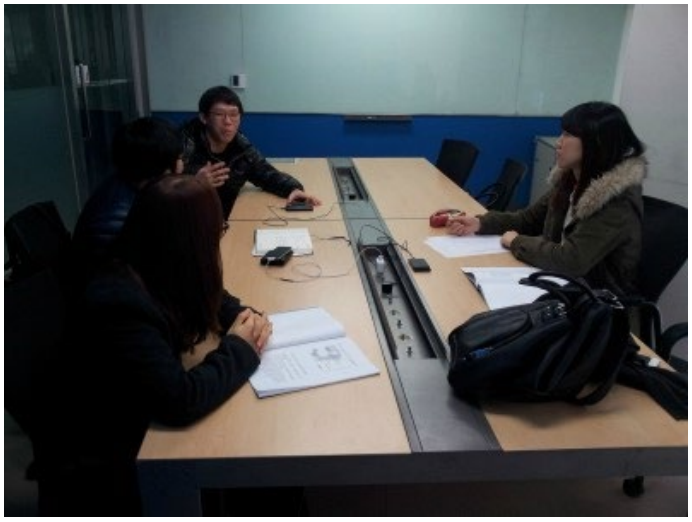
박한근(국어국문 4):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는 모택동이 제창한 공산주의로 회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황규정(국어국문 4): 그 목소리가 어떤 층이 중심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박한근(국어국문 4): 신지식인층이요. 즉, 고위층이 아닌 학생들 말이죠. 시장을 개방하면서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 이를 다시 분배하자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곧 중국 내부 상황도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혼란이 있는 것이, 총수 교체 과정에서 두 파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중국 내에서 불안정이 매우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내부적인 것들이 완비되는 순간 중국은 정말 세계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는 순간, 우리나라는 결국 미국이 아닌 중국 편에 서게 될 것 같아요.

김서영(국어국문 3):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아무리 커진다고 한들, 우리나라가 현재 미국과 맺고 있는 관계나 체제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중국의 편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한별(국어국문 4): 게다가 중국이 북한과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미군이 철수한다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요?

조아영(디지털미디어 2):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상으로도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보다 우호적이지 않나요? 중국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의 반감이 심할 것 같아요. 미국과는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교류를 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노선을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황규정(국어국문 4): 그렇지만, 박한진 학우의 말에는 전제가 있었어요. 현재의 불안정한 중국의 체제가 확립이 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직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땐 이미 중국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조아영(디지털미디어 2): 하지만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일부 지식인층 등의 식견이 넓은 사람들의 인식은 바뀔 수 있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에요.

황규정(국어국문 4): 중국의 체제가 완비되기까지는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동안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이한별(국어국문 4): 일단 중국과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노선을 탄다기 보다는 경제적인 수교와 안정적인 거래의 확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요시장이 미국도 크지만 중국은 더욱 크기 때문에 중국과 수교를 맺자는 것이지 중국의 노선을 타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황규정(국어국문 4): 맞아요. 월례토론회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노선을 타지 않을 것이다.(동반자 관계가 아닌 패권주의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박한근(국어국문 4): 그렇네요. 어쨌든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고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나라는 북한과 분단되어 있다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황규정(국어국문 4): 맞아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우리나라 대응 방식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한별(국어국문 4):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기회주의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지요.

김서영(국어국문 3): 결국 어떻게 보면 현대판 광해군의 중립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대해 정리를 해볼게요. 중국의 급부상이 동북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지만 중국의 현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내부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에 대해 우리가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한별(국어국문 4):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점점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듯이 중국과의 경제적 수교를 이어나갈수록 중국 또한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자동차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을 할 때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생산하여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수출을 해도 허가가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를 허가해주지 않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현지에 공장을 세워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게 하는 등 제약이 많아지고 있죠. 이처럼 중국도 요구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서영(국어국문 3): 즉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무조건 기회주의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여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상대국에 내어주고 감내해야 할 부분 또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이 주 축이 되어 동북아가 협력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미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기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지나치게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지금 미국의 작은 위기에도 큰 타격을 입듯이, 중국의 변화에 매우 탄력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인 수교가 많아질수록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익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때마다 매우 난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황규정(국어국문 4): 월례토론회 토론문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한반도에 대한 미중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서로 배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함.' 저는 '서로 배치되지 않기 위해'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미국과 중국과 협의를 맺고 있는 채널이 겹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익 측면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잘 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서영(국어국문 3):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황규정 학우의 말을 들으니 구한말, 즉 우리나라가 한참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동시에 외국에게 점점 이권을 나누어 주어야만 했던 시기가 떠올랐어요. 그 때 일본에게는 철도 부설권을 주고, 미국에게는 광산 채굴권을 주는 등의 정책이 가능했던가요?

결국에는 어느 한 나라에게 이권을 주기 시작하면 다른 강대국 또한 같은 이권을 요구했어요. 당시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간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채널을 잘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한근(국어국문 4): 하지만 결국 가능하니,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국이 존재해온 것 아닐까요? 결국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김서영(국어국문 3): 결국 우리가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한중일의 관계 구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부턴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볼까요?

황규정(국어국문 4): 한중일은 서로 역사적으로 매우 얽혀있기 때문에 세 나라의 관계는 매우 표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서로 협력을 하자고 약속을 해도 곧 깨지고 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한중일이 표면적인 관계가 아닌 정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에요.

김서영(국어국문 4): 그렇다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협력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별(국어국문 4): 그러한 협력기구를 만들게 되면 결국 가장 세력이 큰 나라가 중심이 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강대국을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기구가 될 수도 있지요.

조아영(디지털미디어 2): 그래도 시도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황규정(국어국문 4): 하지만 그 정도의 표면적인 관계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한중일 중에는 동북아 전체를 아우를 만한 넓은 가슴을 가진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또한 각 나라마다 영토와 역사 갈등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려고 하질 않죠.

또한 현재 한중일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협력이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요. 결국에는 주축국과 파생국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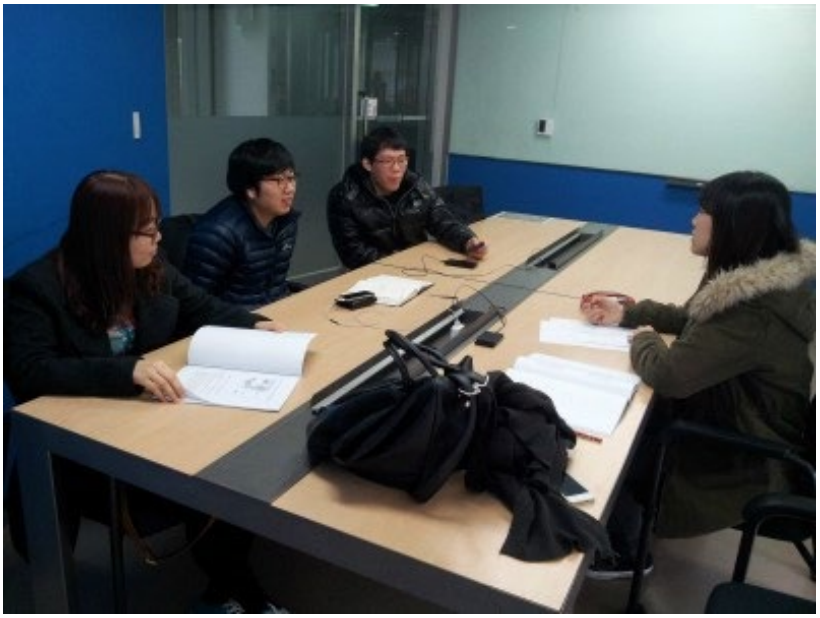
김서영(국어국문 3): 모두 한중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요?

조아영(디지털미디어 2): 지금 북한은 정권교체가 막 이루어져 혼란스러운 시기이므로 이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고, 혹은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한근(국어국문 4):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해주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경의선 철도입니다. 유럽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결속이 잘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운송과정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경의선이 개통하게 된다면 운송과정에 있어서의 큰 이득을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겠죠. 또한 서아시아에서 석유를 수입해올때 더욱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으며 러시아 시베리아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도 손쉽게 운송해 올 수 있지요. 따라서 지금처럼 북한과 냉전 분위기를 형성하며 대치하기 보다는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며 이러한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황규정(국어국문 4): 하지만 북한 자체가 쉽게 개방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의 마음을 천천히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북한에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인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한별(국어국문 4): 북한은 몇십 년 만에 지도자가 바뀌면서 당연히 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내부를 다지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유신정권 때 내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북한을 적으로 부각시킨 것처럼 말이지요. 이처럼 북한의 김정은 또한 자신의 세력과 입지를 다지기 위해 우리나라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아영(디지털미디어 2):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평화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안정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사례로 연평도 포격사건을 들 수 있겠지요. 북한의 도발은 우리나라에게 항상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평화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서영(국어국문 3):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보다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반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조아영 학우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 받는 영향이 큰데, 지금의 이명박 정부처럼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경제적으로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선진화포럼의 이종찬 이사님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하는 등 평화적인 입장을 취해도 북한 내부에서는 입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 즉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강경파가 우리나라에 대해 도발을 하면 남북관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앞으로 계속 북한에 대해 과제를 던져주고, 온건파의 입지를 공고히 만들어 주는 등 이 두 개의 파가 계속 상충하여 남북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두드려야 열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평화적인 입장으로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한별(국어국문 4): 물론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온건파의 입지가 굳혀진다고 해도 지도자의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러워요.

황규정(국어국문 4): 북한의 민중 또한 어렸을 때부터 세뇌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현실에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고, 남한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들었어요. 따라서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적대적인 관계만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서영(국어국문 3): 결국 민중에게 확산효과가 없고, 점진적인 성과가 없을 지라도 우리는 꾸준히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인 것 같아요. 또한 햇볕정책을 시작한지 10 년 만에 대북정책을 바꾸는 등의 변덕스러운 정책보다는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중일은 표면적인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경제적, 사회적으로 협력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셨어요.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을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차기 정부의 역할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11 월 9 일 금요일. 중간고사가 끝나고서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저희는 3 차 연구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여서 준비하기에 벅찬 감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다들 발제문과 영상을 참고하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진행자를 제외하고 총 4 명의 학우가 참가해주었습니다. 9 일 연구모임 시작 약 1 주일 전에 연락을 미리 했었는데 학우들은 준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변해가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걸 알지만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이야기를해나가야 하는건지, 학생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왈가왈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건지 등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연구모임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토론전문 내용을 보시죠.



황재인(디미 2) : 안녕하세요 3 회 연구모임의 주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 이라는 주제입니다. 다들 시작 전부터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월례토론회 내용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제문을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야기해주세요.

김강민(디미 4): 저는 영상을 참고하였는데요. 영상 앞부분에 발제문을 발표해주신 분이 말씀하신게 기억에 남습니다. '동북아 하면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를 떠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지리적으로는 당연히 세 나라의 영역임이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그 가운데 미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는 부분이 공감됐어요.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 '올해는 세계 정권 교체의 해' 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도 재밌겠다 싶었는데 이런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박대윤(디미 1) : 지금 중국이 한참 부상하고 있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중국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병현(디미 2):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발제문에 있던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요즘 떠오르고 있는거 같은데 중국의 정권교체와 주변국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 갈지를 이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전다애(디미 10) : 중국이 떠오르는 것도 그렇고 미국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고 오바마가 재선되었잖아요 그쪽 관련해서도 함께 다루면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일본쪽의 변화도 다루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윤(디미 2) : 기사를 봤는데요. 중국은 체질이 변화하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성장방식을 시도한다고 해요. 점점 고령화되는 인구구조에 대비하여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임금을 올리고 소득이 늘어나게 해서 소비를 더 늘리게 하려고 한다고 해요.

전다애(디미 10) : 중국과 연관이 많은 우리나라도 중국이 그렇게 성장방식을 전환하려고 하면 어떤 영향이 있겠네요.

김강민(디미 4): 그런 전환이 중국이 점점 부상할수록 경제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치니 글로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아직은 당장에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박대윤(디미 2) : 그 얘기를 보면 중국이 임금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물가 상승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데요. 유통, 카지노, 여행 같은 몇 개 업종이 수혜업종으로 된다고 주목된대요. 그리고 중국이 노령화가 되니까 헬스케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럴듯 했습니다.

민병현(디미 2) :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년부터 지도자의 자리에 서면서 사회적 안정문제에 더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급한 경제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내에도 발전에 불균형의 모습이 보이니까 시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차지를 위해서 군사력도 강화하고, 미국의 외교전략이 바뀌는 것에 대응할 방안도 찾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황재인(디미 2): 2 번째 오바마의 시대가 또 열린거에 대해선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거라고 생각들 하세요?

전다애(디미 3) : 외교 방향이 일단 중동과 유럽보단 아시아쪽으로 돌려진게 주목해야 할 거 같아요. 들리는 얘기로는 미국이 '힘의 외교'를 펼칠거 같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북한이랑 중국한테는 강경적 자세로 대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았던거 같은데 중국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미국이랑 예전에 약속을 했었는데 시진핑이 패권을 지양하겠다고 했다가 집권이 곧 되니까 패권적 외교노선을 다시 공식화했다고 해요. 경제력이랑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경한 노선으로 다시 바꿨다고 해요.

박대윤(디미 1) : 그런 식으로 시진핑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좀 강하다고 해요. 뭔가중국이 이제는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그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길 바라면서도 중국의 이익도 역시 보장받고 싶어한다 해요.

김강민(디미 4) :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외교노선이 변화하니까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에서 생존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한게 맞는 실정인거 같긴 해요. 능동적으로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게 정말 답을 내리기도 어렵고 해결책을 찾으려 해도 정말 당연하지만서도 어려운 거 같아요.

황재인(디미 2) : 지금 우리도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찾는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선 시즌이 되면 정책보다는 공방 위주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게 많은거 같아서 아쉬운 점도 많긴 하지만 국민들을 속이려는 정책발표보다는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3 차 연구모임 마칠게요.



⑤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2012 년 현재, 동북아 정세는 1990 년대 초반인 탈냉전 시대와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 년대 초반, 소련이 몰락하면서 미국은 단일 패권을 쥐게 되었고, 일본은 경제위기로 2 차대전 패배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의 가도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북한은 고립이 됐고,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바꿔나갔다. 약 20 년 후인 현재는 중국의 부상, 일본의 장기적 침체, 미국단일 패권의 변화 양상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까지. 게다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리더십 체인지가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한 이 상황은 그야 말로 동북아정세는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시아 각국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한국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연구모임을 통해 논의해봤다.



진행자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라고 하면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동북아시아에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오늘은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와, 다변적인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먼저는 현재 동북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

박지원
평소 뉴스를 잘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정세는 사실 다소 생소하다. 그러나 지난 월례토론회에 참석해보니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일단 중국의 성장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것 같다. 중국은 대륙만 크고 시민의식은 낮은 국가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여전히 그런 인식이 변하진 않았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알려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인접 국가들에게 가변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다.

이종욱
중국이 여러모로 이슈인 것 같다. 학과 수업 시간에도 중국에 대한 교수님들의 언급이 빈번해지는 요즘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눈부시다. 하지만 중국은 빈부격차가 굉장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다고 들었다. 중국은 지금 패권국가가 되는가를 놓고 그 주체로 언급되고 있는데, G2 인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만약 정말로 패권을 쥐게 돼 힘을 갖게 된다면, 즉 내부적인 체제가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는 악영향이 초래될 것 같다.

금재민
나도 뉴스를 잘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자주 들을 수 있었다. 나처럼 뉴스를 잘 접하지 않는 학생이 영토분쟁에 대해 적지 않게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이슈화 됐고, 꽤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알기로는 중국은 일본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조금 전에 영상(월례토론회)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어도를 두고도 영토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이패권 국가로 발돋움을 하는 과정에서 영토에 대한 야욕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진행자
포커스가 중국으로 이어진다. 아무래도 그만큼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국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급속한 경제성장과 시민의식, 패권국가로의 행보, 영토분쟁 등 모두 굴직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번에 지도자가 바뀐다. 후진타오 체제에서 시진핑 체제로 변화를 갖게 된다. 지도자의 성격에 따라 대외적 긴장감이 올라갈 수도 반대로 화해모드가 조성될 수도 있다. 시진핑 차기 정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한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등 자유롭게 의견을 부탁한다.

이종욱
자세히는 모르지만 군부체제의 성격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들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적 색깔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대외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그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 같다.

진행자
말해준 대로 시진핑은 군부적성격을 공고히 해 나갈 것으로 분석이 모아지고 있는 현재다. 미국과의 관계가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미국은 오바마 재선이 유력하다.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오바마 정부가 이어진다면 대화와 협력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새 정권을 열게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롬니는 강한 미국을 주장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더불어 북한 등 이른바 과거에 미국에게 적으로 인식되던 국가들에게 힘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들은 시진핑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박지원, 금재민
특별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진행자
아무래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뉴스를 보지 않으면 잘 알기 어려운 것 같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토분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영토분쟁은 한-일 독도문제, 중-일 댜오위댜오, 러-일 쿠릴열도 문제, 남-북 NLL 문제 등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목해볼 부분은 일본이 교집합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과거 제국주의적 성격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고 보는 분석들이 있다. 또 달리 보면 중국 역시 이번에 댜오위댜오 / 센카쿠 분쟁을 두고서 항공모함 배치 등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켰다. 다방면적으로 영토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해결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박지원
영토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천연자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국익을 위하는 게 맞다. 그러므로 각 국가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쉽게 대화가 오가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실 대화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은가.

금재민
중국은 광활한 대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섬을 놓고 항공모함을 배치하여 지키려 한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다. 그러나 제 3 자 입장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군사적으로 긴장을 유발시켜 주변국에 안보적 긴장감을 유발할 것 같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 군대 다녀와서 알겠지만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조금이라도 대내외적으로 안보위협이 있을 경우 군대는 비상이 걸리는데, 그 중에는 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소모적인 경우도 있다. 중국으로 인해 소모적인 측면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적으로 말이다.

진행자
프레임의 문제다. 영토문제를 접근할 때는 철저하게 제 3 자적 입장에 근거하여 접근해야 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중간자적 관점을 잘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영토분쟁의 교집합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언론은 적대적인 논조로 일본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다. 물론 내가 봤을 땐 독도문제가 발생했을 때(광복절을 기점으로)에는 우리 언론에서는 일본을 비판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런 프레임은 바뀌더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발생하면서 중국에 포커스를 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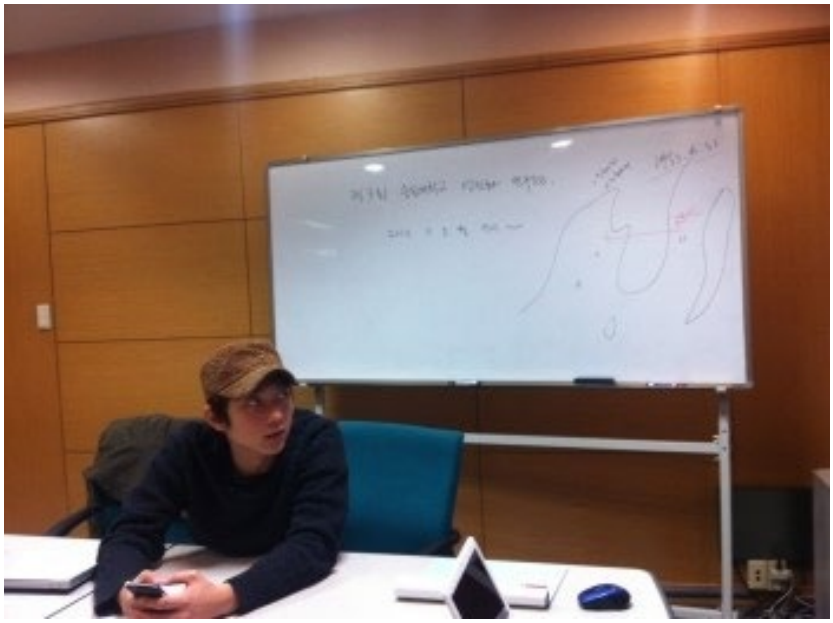
이종욱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한-중, 한-일 관계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여전히 약소국이라는 느낌도 갖게 된다.

진행자
약소국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한국은 중국과 일본입장에서 여러모로 중요한 전략적 국가다.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이종욱
대화밖에 없다. 그리고 양보라고 본다. 그러나 국익을 놓고 양보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한-일 관계에서 독도문제만 언급되면 대화가 단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어느 국가이든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반드시 답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관건일 것이다. 모호하게될 경우엔 제 3 자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나가면 어떨지 생각해본다. 역사적으로 여기는 누구 땅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 다만 이 점을 서로 인정할 때 비로소 영토분쟁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본다.



진행자
2012 년 들어 영토분쟁이 더욱 공론화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각국의 지도자 교체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표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영토분쟁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일본은 극우파가 집권을 앞두고 있다. 일본 극우는 굉장한 민족주의적 노선이라고 보면 된다. 영토를 이슈화시켜 민족적으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장기적 경제 침체가 있었고 지난 해 쓰나미, 원전사고 등 여러 가지로 국가가 혼란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극우파들의 집권은 이를테면 단일화된 일본을 주장이 먹혀 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정권을 교체한다. 그렇기 때문에 댜오위댜오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최근 독도문제 말고 새로 이슈화된 것이 NLL 문제다. NLL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종욱
얼마 전 '여의도 텔레토비'라는 프로그램을 봤다. 거기 보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캐릭터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캐릭터에게 NLL 장풍을 쏘는 내용이 있었다. 거기에 문재인 후보 캐릭터는 감당하기 어려워 하는 모습으로 나왔다. 새누리당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진실논의는 제쳐두고 말이다. 그런데 NLL 이 우리 영토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박지원
NLL 은 우리나라의 작은 섬들이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에 여러 정치적 전략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 야 어느 쪽이든 말이다.

금재민
연평도에서 군복무를 했다. NLL 은 우리 땅이다.

진행자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의견들을 들어봤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 지난 주 발표를 맡아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부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1953 년 휴전협정 당시에 영토는 38 선으로 나눴고, 영해를 나눌 때에 남측과 북측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남측은 영해 범위 3 해리를 주장한 반면, 북측은 12 해리를 주장했다. 당시 미국은 해상전에서 어렵게 작은 섬들을 점령했다. 그래서 남한군이 주둔해 있었고, 그런 가운데 휴전협상이 진행됐다. 협상은 결국 남측이 영해의 측면에서는 일방적 통보를 하고 마무리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남측 대표자이다. 휴전협상은 남측에서 유엔군의 클라크 사령관, 북한의 김일성, 중국의 평더화이가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휴전이 될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유엔군의 설득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유엔군은, 유엔군사령부를 줄인 말이다. 이렇게 보면 유엔 산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비롯한 참전 16 개국의 연합군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 유엔산하의 군대는 "통합사령부"였다. 유엔군은 미국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고, 군사지휘체계 역시 유엔이 아닌 미국정부와 연계돼 있었다. 결국, 유엔군은 제 3 자, 중간자가 아닌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도, 변호사 출신인 그는 이런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데 핵심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금재민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땅이 아닌가? 좌파의견은 아닌가?

진행자
좌파의견이 맞다고 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하나의 영토분쟁이다. 역사를 거슬러 대화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이 진실인지는 더 공부해봐야 할 것 같다. 다시 2012 년으로 돌아오자. 동북아시아는 여러모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중, 한-미, 한-일 그리고 남북문제까지 고루 신경 써야 하는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금재민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알겠지만, 미국과의 동맹은 필연적이다. 사실 2015 년에 있을 전시작전권 전환도 걱정이 된다. 그러나 중국을 생각하면, 또 북한을 생각하면 미국과의 견고한 결속은 여러모로 하나의 줄다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국가 하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상당히 조율을 잘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것이고.

이종욱
중국과 미국이 대립의 관계가 아닌 공존, 협력의 길로 간다면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디딤돌이 될 것 같다. 일본의 경우엔 한-일수교라는 굴욕외교, 굴욕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좀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은 내리막을 걷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앞으로 동북아에서 중요한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기에 일본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외교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북한문제는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 정부와 북한 국민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

진행자
북한 정책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통일이냐 아니냐인데, 통일을 놓고도 방법론에 많은 의견이 있다. 그런 건 제쳐두고, 통일과 비통일 즉 통일이 아닌 경우엔 평화체제론이라고 하여 남북 각각의 체제로 가는 것을 말한다. 상호 존중하는 것이다. 다만 인권문제 등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개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즉 정치시스템의 이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민주주의를 심어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말하자면, 재민 학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재민
북한을 안고 중국과 협력하며 미국,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 특정 국가에 편중된 외교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새로운 악을 불러올 수 있다.



진행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는 정말 지혜로워야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가장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한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교체가 더욱 중요한 것이고, 바른 역사를 알고 그것을 올바로 주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위로는 북한과 러시아를 두고 있는 한편으로는 난감하리만큼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를 표방했던 일본이나, 스탈린을 연상하게 되는 소련이나, 핵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 그리고 인권문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중국 등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미지가 나쁘지만은 않다. 이 점을 잘 활용하여 전략적 외교가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는 미국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다. 친미파는 아니다. 그렇다고 반미도 아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어느 부분에서는 좋은 영향력을 줬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다. 딱 적당히 하는 외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다. 감사드린다!

숭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봤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복잡한 상황이지만 한-중, 한-미-일, 남-북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가야 할 때다. 더불어 새로 집권하는 각 국가의 지도자들은 과거와 현재에 보다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 더욱 힘쓸 것을 기대해 본다.

⑥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최근 주요국가의 정권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외교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중 간의 관계에서 과연 한국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차기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경북대학교 학생들과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김정원(경영 2):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토론할 주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입니다. 중국이 G2 로 성장하면서 세계의 질서 자체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질서 역시 급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이에 따라 한국도 대응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집중 논의해보고 북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승민(전자 3):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시진핑이 권력을 승계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시진핑총서기는 국내의 경제성장과 분배에 초첨을 맞추었기 때문에 국외 중국의 세력확산에는 당분간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키신저의 말처럼 양국이 갈등을 피하면서 공동진화를 지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중간에 갈등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경제통상 4):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미국 채권보유 1 위국가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과거에는 8~9%의 경제성장에만 집중해서 외교적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므로 주변국가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어난 센카쿠 열도 문제나 그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를 미국측에 개입하지 말라고 시진핑 총서기가 말한 것으로 보아 그의 동북아 패권 장악 야심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서 오바마 정부가 중국에게 위안화 절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때 일본이 플라자회담에서 엔화절상 요구를 받은 것처럼 중국에게도 요구를 한 것이죠. 따라서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외교적으로 조금 압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 채권보유국 1 위 답게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중 관계는 조금 악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원(경영 2):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 확대를 높이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태석(전자 4): 지금 양간 구도가 미국과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에게 치중할 수 있는 정책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을 조금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미국과는 우방국가였고, 북한은 현재 같은 공산체제로서 중국과 우방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지금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가까워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립심을 키우고 중국과의 외교를 조금 늘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권수정(경제통상 4):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거리를 두면서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나라에게만 치중하게 된다면 후에 저희가 한쪽에 휘둘리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여러 나라에 분산시킨다면 후에 무역이나 국제 관계에서더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선(간호 3): 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을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중국에게 의존도를 점점 더 키운다면 어느 나라든 의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립심은 부족하게 되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여우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저울질하면서 자립심을 점점 키우는 것입니다.

예승민(전자 3):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미국이 저희가 전략을 수정한다면 저희에게 확실한 우방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관계입니다. 자유주의체제도 아니고요.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를 줄이고 중국과의 관계 확대는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시영(경영 2): 저도 동의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시진핑이 6.25 가 정당한 전쟁이었다고 발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공산주의 북한을 지지하고 감싸주는 행동이었는데요. 그의 생각에서 중국과의 관계 확대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영국과 독일에 끼어서 양측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독일을 조금 더 지지했는데 그것이 2 차 전쟁으로 악화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호윤(경영 2): 저도 아직까지 군사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는 아직까지 분단 국가이고 북한과의 전쟁 휴전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미국과의 외교를 줄어 중국으로 확대시킨다면 주한 미군 주둔 자체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주한미군의 전력이 상당하고 저희가 군사적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원(경영 2): 네 그렇다면 넘어가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다음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현 정부처럼 실리외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햇볕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승민(전자 3): 저는 지금 현정부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리를 따져서 외교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외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퍼주기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경제통상 4): 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한민족으로서 외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이념의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석(전자 4): 북한은 지금 궁지에 몰린 쥐 같습니다. 무력도발도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본인들이 자립심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압박해오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듯 무력도발도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주 수입원이 마약밀매와 무기수출인데 여기서 더 압박을 주면 무력도발도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 무역과 외교적으로 압박해오자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국지도발사태를 일으켰는데요. 지금 현 정부가 실리외교로서 '너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한다'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해주겠다'로 바뀌는 게 옳다고 봅니다. 햇볕정책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더 좋다고 보고요.

김시영(경영 2):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물론, 햇볕정책의 취지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지원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외교적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북한이 나중에는 더욱더 우리와의 외교에 원하는 것도 많아지고, 우리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경선(간호 3): 하지만 지금 북한도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젊은이들도 그렇고 김정은도 유학파이니까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골수 공산주의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식량지원뿐만이 아니라 조금씩 문화전파도 해서 지식인층을 포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윤(경영 2): 저는 인도주의적인 것은 좋지만, 퍼주기식 외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쓰는 과정을 명확히 해서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온전히 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승민(전자 3): 저도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북한이 줄다리기 식으로 외교를 펼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조금 끌려가는 외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민족이라는 감정적인 외교는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외국친구들에게 북한과 남한이 한나라인 것 같냐고 물어본 적이 잇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같은 나라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50 년 전만 해도 한나라였고 같은 언어도 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의 나라도 30 년 전만 해도 같은 나라가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나라가 자신들과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북한과 50 년이나 지났으니 다른 나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에게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고마움을 알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태석(전자 4): 아이니까 어느 정도 아이가 클 때까지 부모처럼 돌봐주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자립심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중국에게 끌려 다니는데 자칫하다가 동북공정이나 이런 중국의 북한 포섭작전에 의해 넘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 우선 아이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커져서 자립심을 가지게 된다면 중국에게 끌려 다니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예승민(전자 3): 그런데 저희가 과거 햇볕정책을 추진했었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연 포용적인 것이 결과적인 측면에서 얻은 것이 있냐 의문이 듭니다.

박경선(간호 3): 그러나 개성공단이나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정책이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얻은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무력도발이 자주 일어난다면 국민들의 불안감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승민(전자 3): 그러나 서해대전 같은 것을 보면 또 포용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해서 무력도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무력도발을 하는것을 보면 북한은 까치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석(전자 4): 하지만 제 생각은 저희가 무엇을 바라고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주다보면 그쪽에서 선진화되는 속도가 높아질 것이니까 후에 통일을 위해서도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승민(전자 3): 그러나 말에게 물을 먹으라고 물가로 데리고 가도 말이 자신의 의지가 없다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화되는 속도가 좋아지더라도 그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압박하다 보면 오히려 어쩔 수 없이 경제개방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때를 노리는 것이죠.

박경선(간호 3): 저는 압박보다는 지원을 해주면 개방정책을 더 빨리 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아직 어리고 신격화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안정이 되고 신격화 작업이 완료된다면 김정일 김일성과는 다르게 개방정책을 펼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호윤(경영 2): 요즘 tv 를보다 보면 탈북미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남한노래와 드라마도 많이 본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가게 되면 젊은 층들이 남한에 우호적이게 되고 후에 북한 전체가 남한에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시영(경영 2): 저도 생각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정책도 좋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투자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통일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박경선(간호 3):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대북정책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입장에서는 우방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요구를 많이 해볼까 생각하고 또 강경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무력도발을 늘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북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정권이 바뀌더라고 그대로 추진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영(경영 2):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너무 바뀌는 정책 때문에 북한과의 외교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통일까지 염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원(경영 2): 네 알겠습니다. 저도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때마다 바뀌는 대북정책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과의 관계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저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광해군의 전략처럼 실리적인 외교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광해군이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취했던 외교정책처럼 말이죠. 그럼 제 3 차 경북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⑦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민숙희(영어 3): 이번 69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 이었는데요. 세계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과 최근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중국, 북한의 지도부 교체를 포함해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샛별(외교 2): 일단 요즘 세계 정세가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G2 라고 미국과 중국이 경제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동영상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변화에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김현정(외교 2): G2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경제적으로 중국이 많이 발전함으로써 과거 미국 중심의 경제가 아시아 쪽으로도 약간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원(외교 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발표한 국방전략인 '신(新)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을 미래의 라이벌로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이제 중국이 GDP 2 위로 급부상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북한과 남한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중국이 미래에 미국을 따라잡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숙희(영어 3): 네, 관련 기사는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2016 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 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보은(외교 1):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분야를 떠나서 저는 관광사업 쪽 기사를 봤었는데요. 지금 관광산업분야에서도 일본, 중국관광객이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제주 면세점이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급 부상중인 중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김해림(외교 1): 현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북아 역사전쟁'이라고 요즘 갈등과 대립이 심하잖아요. 한·중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등 외교적 대립이 있어서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구슬희(외교 1): 맞아요. 독도 문제로 신경이 엄청 날카로워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일본도 그렇고.. 한중 사이에는 고구려를 둘러싼 문제도 있고..또 중국과 북한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한 것 같아요.

민숙희(영어 3): 네, 북한과의 관계가 가깝다고들 하는데 이것에 대해 좀 더 말해주실 수 있나요?

김지연(외교 2): 제가 말해볼게요.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고 실제로 2011 년 중국과 북한의 교역은 전년 대비 62%가 증가한 약 56 억 2 천 9 백만 달러로 총 교역 액 63 억 2 천만 달러 중 89.1%에 달한다고 해요.

민숙희(영어 3): 네. 감사합니다. 보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한국 방문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뿐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풀 문제가 많은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각자의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성경(외교 2):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중국시장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부상하고 있지만 중국은 땅이 너무 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런 미개발지역에도 발을 넓혀야 할 것 같아요.

김지연(외교 2): 동의해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전략적으로 하는 산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요 도시들만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도 접근해서 그 지역에서 하는 산업들과 협력해서 양 국가 모두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박창일(외교 1):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 의회가 발간할 '중국 역사 속에서의 한반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라는 보고서에 고구려가 중국 땅의 일부였다는 의견이 담길 거라고도 하니까 이거에 대해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한중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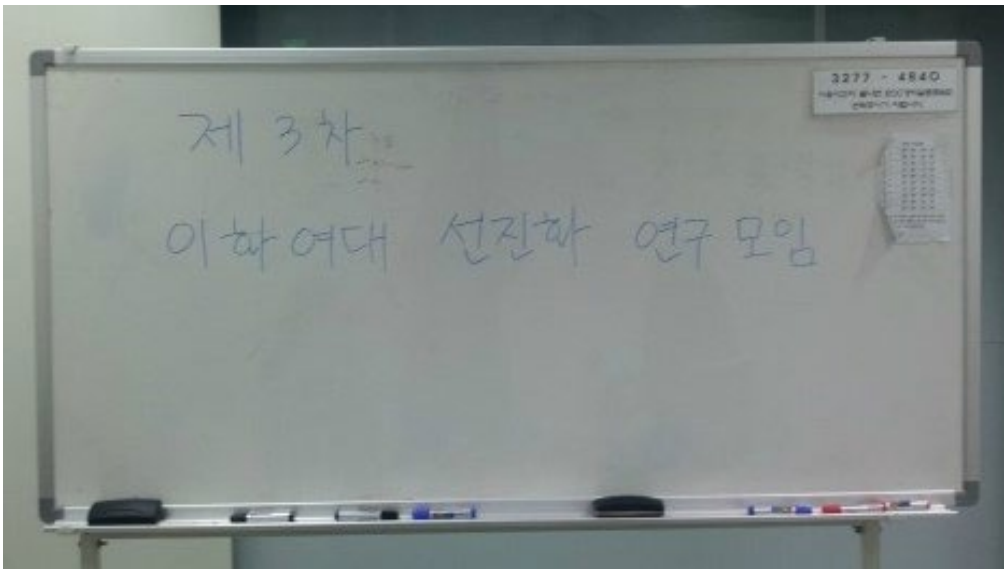
김샛별(외교 2):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외교 전략(Pivot to Asia)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핵심 동맹국인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해요.

신용원(외교 4):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20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앞으로도 관광, 경제, 정치적으로 중국정부와 계속적인 교류를 해서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보은(외교 1): 제주도에도 중국인들이 관광을 무비자로 오고 있고 우리학교에도 보면 외국인 학생 중 반 이상이 중국인 유학생들이니까 앞으로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숙희(영어 3):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류를 넓히고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우호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⑧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11 월 15 일 목요일 늦은 6 시 30 분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복합단지 세미나실에서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크게만 느껴지는 주제에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토론을 시작하고 우리들의 시각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주원(영문) :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69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동북아 정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인데요.



유민경(사회과학) : 이제는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시대가 변하고, 국제 정세도 그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잠시라도 놓치면 그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척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유주원(영문) : 그렇습니다. 정말 시대의 흐름을 쫓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를 말하면서 중국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중국의 성장세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임성은(영어교육) : 여러 국제회의 등에서의 위치를 보면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중국이 있구나 싶어요. 미국이 견제하는 것도 느껴지고.

유주원(영문) : 맞아요! 미국 지도부 내에서도 중국의 성장이 큰 관심사라는 것을 봤어요.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만큼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G2 로 이제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강국이 되었으니 미국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정경민(스크랜튼) :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일종의 '중립외교'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빠르게 변하는 국가정세 가운데 어떤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관계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연수(사회과학) : 미국과 중국이 계속 충돌한다면 우리나라에 경제, 군사, 외교적 문제에 대해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때 우리나라의 선택은 아시아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잘못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특히 이 부분에서 대북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유주원(영문) :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대북문제가 빠질 수 없지요. 미국과 중국의 대북 문제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관심을 쏟는 반면, 중국은 북한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유민경(사회과학) :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 중요하겠네요. 미국과는 현재까지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해요. 또한, 중국과도 더 많은 대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는 그동안 다양한 교류를 통해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중국과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잖아요. 부족한 소통을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야 해요.



임성은(영어교육) :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해요. 다자 협력을 통해 국가 간의 긴장을 풀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중국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을 찾는 것이지요.

유주원(영문)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네요.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북핵문제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4 대 세습체제인 김정은 정권이 출범했는데요.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의 최대 업적을 핵무기보유국가로 격상시킨 점을 부각하며 핵무기개발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서연수(사회과학) :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핵문제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제지될 필요가 있고 이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죠.



정경민(스크랜튼) : 특히나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외교적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로 말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하여 도발하지 않도록 강경하게 나가며 제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미국과 같은 주변국과 공조하여 대북제재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임성은(영어교육) :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도 북한과의 평화 관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 역시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잖아요. 북한과의 통일 또한 한반도의 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주원(영문) :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한 이 과정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나라와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네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 토론해 봤는데요. 특히나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변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 또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로 균형을 유지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대북문제에 관해서는 핵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조사해오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의견들로 토론에 참여해 주어서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3 차 토론의 주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처방법이었는데요. 주제가 정말 넓어서 소주제를 잡고 토론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책임과 책임감, 그리고 둘째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세에 관여도였습니다.



송민영: 오늘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주제가 넓은 감이 있어서 변하는 동북아 정세의 어느 부분에 대해 다룰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토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연: 동영상을 보니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되던데 이 주제를 먼저 다뤄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요즘 중국과 일본 간의 해양영토분쟁,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분쟁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송민영: 언급하신 영토 분쟁 사례 중에서 공통분모로 제시되는 국가가 중국인데요. 중국이 세 나라 중에 가장 영토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영토분쟁의 주요 국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소은: 제 생각에는 해양영토를 중국이 많이 탐내는 이유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양영토에서 뽑아낼 수 있는 자원의 종류와 양이 많아진 것과 관련이 많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같은 해양영토라도 그냥 작은 섬의 면적으로만 보였다면 요즘에는 그 아래 묻힌 천연자원에 값을 많이 매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토의 면적을 넓히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더 많은 자원을 축적하려는 욕심 때문에 영토분쟁의 주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현주: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국의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과 한국의 영토분쟁만 보아도 독도라는 땅 자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보다는 그 아래에 묻힌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발전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도라는 땅 자체도 물론 영토면적이 적은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게는 중요한 자원이 되겠지만 평야가 넓은 곳도 아니고 주로 돌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도를 둘러싸고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 자원 때문일 것입니다.

홍유리: 그러나 중국과 한국 사이의 영토분쟁은 자원에 대한 논의 외에도 특이하게 역사의 왜곡이라는 내용도 포함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고구려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왜곡하여 기억하는 동북공정이 이슈화되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송민영: 저도 동북공정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사건은 자원에 대한 중국의 욕심이 목적이 되기 보다는 중국 내의 여러 소수민족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러 이슈화한 사건이라고 말하던 것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자신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자국의 안정을 서로 상반되는 가치로 보는 것일까요?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자국의 안정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한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는 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홍유리: 중국도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자신의 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일단 자국의 안정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갈리는 상황이 올 때는 자국의 안정을 먼저 선택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목적은 자국의 자립을 유지하고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자신의 이익을 강화할 방안을 발견한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약간 위기에 처해도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공정의 케이스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자국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역사를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건수를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을 행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 자국을 더 우선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연: 저도 홍유리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강대국으로 급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아직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최우위를 점령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무시하지 못할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내에서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 중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힘도 커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국력을 강화하는 데 눈치를 보지 않고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강현주: 맞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런 역사 왜곡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더 큰 제재와 반발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국력이 아직 그 수준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호소할 수도 없었고, 또한 호소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이 특별하게 제재를 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늘고 있고 또한 중국의 군사력도 나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점점 강력해 질수록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책임이 높아지겠지만 오히려 책임감을 덜 가질 수 있습니다.

김소은: 그러나 점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아무리 중국이 강력해 진다고 해도 스스로 국제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책임을 아예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인터넷이 보급이 되지 않아서 국가간의 장벽이 높았을 과거에는 한 강대국이 독선적으로 행동해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국제사회에서 혼자보다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강대국이라도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나라의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자국의 안정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쉽게 자국의 안정만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 내에서 안정을 제한적으로 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송민영: 미국이 초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질서를 따르려고 노력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례토론회에서도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대해 얘기하는 데 미국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강현주: 미국이 비록 지고 있는 태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을 불문하고 어느 나라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홍유리: 저는 미국이 우리 나라가 분단을 겪을 때 도움을 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도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와 미국이 군사적 동맹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주변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분단 상황에 미국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도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변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소은: 저도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미국의 얘기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가 자체적으로 정세를 얘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좀 슬프기도 하네요.

송민영: 그래도 전처럼 약소국의 목소리가 아예 무시되는 시대는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국제적으로 소통이 확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기간 때보다도 일이 더 많아서 모이기 힘들었을 텐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한다라는 폭넓은 주제로 대화를 이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이 다른 곳으로 많이 새지 않았던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⑨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번 달 원광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원들은 강대국의 변하는 리더와 그에 대해 한국이 받을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토론해보았습니다.

유선미(신문방송 3): 안녕하세요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월례토론회 주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인데요, 그 중에서도 강대국들의 리더십교체로 인한 각 나라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한 어떤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균(신문방송 3): 중국은 이번에 시진핑이 새로운 주석이 되면서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6.25 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으로 보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많은 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면, 저희나라가 추구하는 남북과의 통일은 아무래도 힘들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재형(법학과 3): 또한 시친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성장분배에도 신경을 쓰겠지만 산업 구조조정 같은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큰 목표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창희(국어교육 4):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호전적이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잠잠해진 동북공정에 대해 활발하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며, 이미 몽골 등 다른 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우(소방행정 4):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견제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훈(소방행정 3): 앞서 토론회에서 중국의 달러 보유화로 인한 미국경제를 압도하는 상승세를 보이는 중국의 경제력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우 (소방행정 4): 중국은 돈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경제하락으로 인해 돈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상품화를 시킵니다. 대표적으로 한류열풍으로 인해 일본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횟수는 어마어마 합니다. 욘사마의 상품화 및 브랜드로 인해 엔화를 벌어들이면서 문화전파와 발전 등으로 경제력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지혜(신문방송 3): 중국과 관련돼서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저희에게는 통일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듭니다. 독일의 통일처럼 북한의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독에 자유선거를 통한 지도부를 만들어 통일 협상을 이끄는 일체의 과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성(정치외교 3): 강대국의 연쇄적인 지도층 교체로 인한 변화된 리더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안보리더십을 갖춘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변화하는 정세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류가 오고 갈 것이며, 새로운 정세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교류에 있어서 자국을 보호하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밑받침 또한 중요하겠지만 군사력, 즉 안보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위상은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예슬(신문방송 3): 여기서 중국과의 동북공정, 일본과의 독도문제, 북한과의 한반도 문제와 같이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여기서도 우리나라의 국제무대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잘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함으로써, 그 외의 것들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는 하지만 미국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는 자국의 실리를 위해 우리의 손만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스스로의 힘을 찾기 위해, 국제 이해관계 속에서 안보를 쌓아갈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차순영(군사학부 3): 안보를 드높이기 위한 군사정책 중 하나로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점진적인 모병제를 실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식무기와 무리한 국방비 투자는 국제사회에서도 바라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의 재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의 체제와 군대에 대해 인식을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모병제로의 전환을 하였으면 합니다. 모병제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군의 사기는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군대의 발전에 더욱 더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우(군사학 3):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김정은의 정치체제 방향인 경제 개선 노력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전제로 한국은 북한을 정상국가화의 길로 유도하는 한편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봅니다. 또한 대북정책의 대상을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추진해나가되 대북 경제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환경·의료분야 협력 등은 나름대로 별개 차원에서 추진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이미성(정치외교 3): 앞에 말씀하신 분의 의견에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북한이 1-2 년 내 경제적 업적을 시현하지 못할 경우, 신 지도부와 기존 권력층간, 노동당과 군부 간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도 최악의 경우 북한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우(군사학부 3): 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자면, 김정은이 아무리 물질적 요구와 핵개발, 미사일의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북한에게 지속적인 쌀과 식량지원으로 전쟁억제, 핵 개발억제를 자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북한은 우리나라의 1970~80 년대의 경제상황이라고도 말하듯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발전보다는 앞날의 먹고 살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리더십 교체가 되었더라도 도발을 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선미(신문방송 4):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시점이고 중국 체제에 맞게 우리나라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제 3 차 선진화 스터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최근 동북아가 시끌시끌하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시간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분쟁은 확대되어 중국 내 반일 폭력 사태까지 빚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은 경제성장을 통한 재부상으로 세계 제 1 의 강대국인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일본은 위기의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경제 질서에도 대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대응전략을 가져야 할까?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토론해봤다.



보라: 안녕하세요.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한국의 대응방안' 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 체제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는 12 월 19 일 대선을 통해 새로운 리더를 선출합니다. 일본도 내년 쯤 차기 정권이 수립될 예정이라는데요. 이렇듯 한-중-일 그리고 미국까지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며 동북아 전체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G2 로 거듭났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또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모릅니다. 앞으로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할 중국의 미래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효주: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상으로도 근접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한국이 대외 수출의 20~30% 정도를 중국에 기대고 있다는 근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했던 중국의 경제성장이 최근 들어서 침체기에 들어갔잖아요. 시진핑이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중 무역 방법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경제성장이 주춤한다는 이유로 내수경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새로운 무역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라: 중국의 경제 성장의 둔화와 시진핑의 경제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해주셨습니다. 경제 분야에 미칠 영향을 짚어주셨는데요. 새로운 무역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효주: 중국이 내수활성화에 집중한다고 했으니, 한국도 중국의 내수 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각종 소비재를 통해 그들의 지갑을 여는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주로 밀었던 무역 상품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라: 국내 경제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 역시 'L 자형 경기침체' 모양이 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효주양도 그 문제를 캐치해 이러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지원: 한중 FTA 체결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국의 성장이 지금처럼 중성장 형태를 보인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중 FTA 를 체결해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한다면 지금의 우려를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내수시장 접근성을 강화한다면 중국의 경제 침체가 가져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현: 하지만 한중 FTA 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장 국가 전체의 대중 수출 감소를 의식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향후 농가의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난 2000 년에 발생한 '마늘분쟁'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라: 한중 FTA 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월례토론회 주제로 선택해 토론했던 이야기인 만큼, 이 자리에서 소주제로 다루기에는 너무 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원이의 입장은 향후 한국의 대중 수출도가 낮아질 것을 대비해 한중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비: 저는 경제적인 부분의 변화보다 정치적 부분의 변화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난 4~5 년간 중국의 위상은 그야말로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을 할 때 중국은 자신들의 힘이 거세졌음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중국 내 일본 기업을 부수고, 방화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이 '일제 보이콧'을 외쳐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죠.

수진: 아 맞아요. 국민적 차원에서 폭력을 가했을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척 차원에서도 센카쿠 열도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고 군대를 배치하는 등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줬었죠.

솔비: 그렇습니다. 얼마 전 중일 분쟁에서 보여준 중국의 태도는 G2 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힘을 실감케 했습니다. 문제는 이 힘의 방향이 한반도로 향했을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인데요. 현재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시진핑도 이를 놓치지 않고 북한을 개혁 개방의 장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진: 동의합니다.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치겠지만, 한반도 전체를 생각한다면 중국이 정치, 외교적인 부분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최근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2005 년 52%에서 2011 년 89%로 늘어났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한국은 물론 북한 경제에도 중국이 갖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앞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의 핸들을 중국이 잡게 된다면

북한문제에서 한국이 갖는 입지가 지금보다 더 작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고도화된 대북정책을 세워, 북한에서 늘어만 가는 중국의 영향력 막아야 합니다.

효주: 이번 월례토론회 발제영상에서도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왔죠. 중국과 북한이 긴밀한 관계라는 것은 맞지만 그 중간에는 핵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3 년 2 월 후진타오는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했어요. 북한이 지금처럼 핵을 잡고 놓지 않는다면 명분이 없기 때문애 중국도 적극적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적극적 개입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라: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결된 부분이므로 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중 외교의 미래,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소현: 현 정권에서는 너무 대미 외교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G2 의 패권경쟁으로 미중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불균형한 외교자세를 보인다면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저는 중심을 잡고, 여기에 조금 더해 화중의 자세를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 중국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졌습니다. 추후 한반도 통일을 생각하고, 좁게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MB 정권처럼 친미 외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친중 외교적 자세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진: 중국의 힘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중국은 거대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발제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만 염두에 두고 양국관계를 논하기에는 한국과 중국은 복합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중의 자세를 취하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솔비: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외교전략에 달려있습니다. 중국이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중국과 교역을 넓히고, 친중적 자세를 보인다면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을 생각해도, 미국 역시 북한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중 관계 강화와 한미 관계를 별개로 두고 대중 외교를 진행해야 합니다.

효주: 시진핑 시대의 한중 외교는 후진타오 시대와 크게 다를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오바마가 재선한 이상 한미 외교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한국은 그때그때 우리의 이익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친미, 친중, 화중과 같이 어떤 외교적 기조를 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보라: 외교관계의 기본은 '영원한 우방국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 입니다. 효주양은 외교의 기본에 입각해 대중 외교의 비전을 제시해준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이슈인 '경제'와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차기 정권의 대중 외교가 앞으로 한반도 미래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영원한 우방국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라는 것이 외교관계의 기본이지만, 어쩐지 일본은 '영원한 적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례토론회에서는 일본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발제영상에서는 중일 관계와 중일 문제가 갖는 경제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셨는데요.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일본이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등을 건드리면서 한국을 도발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문제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불시에 독도를 방문하고, 천황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은 적극적 대응은 일본의 도발에 휩쓸려 싸움장에 끌려가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일본에는 무대응이 최선이라 봅니다.

효주: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하루빨리 사과와 보상을 받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자로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몰상식한 행동을 도발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 받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수진: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주로 역사적인 근거만 내세우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역사적인 근거는 큰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독도 방위대를 만들고, 또 독도를 교과서에 실어 전국민에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인식시키는 것을 보고 분노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과거의 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실효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현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솔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의 변화가 굉장히 큰데, 왜 월례토론회에서는 한일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들의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한데 아무튼 저는 수진언니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이성적 논리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만 국가가 공식적인 대응을 할 때는 이성과 논리가 앞서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황에 사과를 요구하고 급작스럽게 독도에 방문하는 일은 현 정권이 보여줬던 대일 외교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고, 그 과정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전문가분들이 생각하는 대일 정책은 무엇일까요? 이번 토론회에서 일본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아 아쉽습니다. 일본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본을 싸움의 대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차기 정권에서는 영토문제와 과거사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본을 '싸움의 대상'에서 '성장과 화합의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중 하나는 바로 북한입니다. 김정은 체제로 변화하면서 북한 내부에도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변화의 한 축으로 보입니다. 북한문제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나요? 좀 전에 중국문제를 다룰 때 자세히 다루지 못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현: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 정책 성적을 매겨보면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G20 정상회담 유치부터 최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재 진출까지 MB 의 실용외교를 마냥 저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북정책 만큼은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과거 퍼주기식 외교를 지양하고, 북한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비핵 개방 3000 전략을 발표하고 이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이 없잖아요. 차기 정권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솔비: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아주 다른 방향이었지만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핵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고, 북한의 일방적인 떼쓰기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오히려 잘한 일이라 생각해요. 따라서 저는 차기 정권도 지금의 대북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이 시간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너무 한정된 이야기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차기 정권은 어떤 대북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북한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과 비슷할 정도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태풍 피해를 의식한 한국의 라면과 밀가루 등 수해지원을 거부했죠. 그 양이 굉장히 적어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죽어가는 인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국가의 자존심만 세우는 북한을 보며 차기 정권의 대북정책이 진짜 중요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북한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더욱 방만하게 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MB 정권처럼 각을 세우고, 벽을 두는 대북정책은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 그 어떤 위협적 행위도 서슴지 않게 될까 문제입니다. 혹시 차기 정권에게 바라는 대북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주: MB 정권의 대북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평화 유지를 기본으로 한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면 북한만 위험한가요? 아닙니다. 그 위험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멀리 통일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경제지표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2010 년 연평도 포격사건만 봐도 그래요. 당시 코스피 지수가 48.8 포인트나 내려갔다고 합니다.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은 한국의 경제, 나아가서는 통일비용을 고려한다면 북한에 인색하게 굴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진: 효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장 북한이 핵 실험을 한다는 소리만 나와도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도가 급감합니다. 2006 년 그리고 2009 년 1,2 차 핵 실험 때 코스피 지수는 각각 32

포인트, 48.8 포인트 하락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북한의 안정을 가져오는 대북전략이 우리 경제에도 안정을 가져옵니다.

지원: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대북정책을 말하려면 코스피 하락만 중심으로 두고 말하면 안 돼요. 평화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을 하려면, 그만큼 대북 지원을 늘려야 하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보라: 2 학년 때 북한관련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그 당시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북한과 한국의 싸움은 '치킨게임' 이라는 거에요. 치킨게임은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을 말하는데요. 양쪽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먼저 방향을 틀어 충돌을 피하면 내가 겁쟁이가 돼서 지는 거고, 계속 직진하면 충돌해 둘 다 피해를 안고 지게 된다는 것이죠. 북한과 한국도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숙이고 들어가자니 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니 충돌 시 그 충격이 너무 크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충돌을 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왜냐면 누군가 한 쪽은 충돌의 결과물을 다 안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북 정책을 승 패로 나누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지지 않는 정책을, 그리고 한쪽이 무너지게 될 경우 우리가 갖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현: 한국과 북한의 대화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나가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요.

수진: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좁게는 한국, 중국, 일본이 모여 대화할 수 있는 대화 기구를 마련해보면 어떨까요?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서로 날을 세우고 있지만 대화 협력을 통해 동북아를 세계의 중심으로 이끈다면 각 국가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원: 맞아요. 각 대화를 통해 동북아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패권의 중심이 동북아로 이동될 것 같습니다.

보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이 마무리되고 차기 대통령 선출을 앞둔 지금, 한국의 외교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국가 비전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⑪ 청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고,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에서 시진핑으로 권력 교체가 진행 중이다. 경제력에서 일본을 제치고 G2 로 성장한 중국은 경제와 북한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이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만큼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철우 : 안녕하세요. 이번 3 차 선진화 연구모임 주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입니다. 최근 진행 중인 권력교체는 앞으로 중국의 최대 10 년을 이끌 지도부로 정치, 경제, 사회, 북한 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각자 생각하고 있는 현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예리 : 권력의 교체가 있긴 하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우호적인 것은 결국 중국의 국익을 위해 그런 것인데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불안정했던 북한이 김정은이 예상보다 권력을 잡고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굳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본인들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들도록 할 거 같습니다.



안성모 :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북한의 중국무역 의존도는 2010 년 83%로 07 년 67.1% 08 년 73%, 09 년 78.5% 로 수직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리 학생 말처럼 현재도 충분히 북한은 중국 없이는 국가 유지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할 듯 싶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통일 후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부담해야 할 정치적, 경제적 손해가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현재 파탄된 남북관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됩니다.

안태식 :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도 유의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정권은 지난 재임기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식량지원을 하는 양면정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임기인 오바마로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 직접 대화로 선회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지도부 교체에 이어 한국, 일본 역시 내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만큼 미국의 대북정책은 과거보다 이번 2 기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우 : 네 모두들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변화될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엔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볼까요?



양나영 : 미국 달러의 가치와 미국 신용등급의 하락 그리고 중국의 미국채권 소유 세계 1 위 등은 미국이 동아시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입니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중국에게 넘겨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태식 : 우리나라의 중국 교역액은 2011 년 기준으로 2206 억 달러 한미 1008 억 달러, 한일 1080 억 달러로 한미와 한일 간 교역을 합쳐도 넘지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값싼 노동력에 따른 저가 완제품과 지리적 이점으로 인하여 그런데요. 물론 중국 역시 한국은 제 4 위의 수출국이자 제 2 위의 수입대상국으로 한국 경제에 많은 이익을 주는 국가이지만 문제는, 중국이 경제전략을 대외적인 방법보다 내수전략을 펼칠 경우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것이란 겁니다. 무역국가를 다변화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예리 : 저는 중국과의 교역액이 높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제 2 의 수입국이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제품이 다른 어떤 나라 제품보다도 중국시장에 통한다는 얘기이며, 한류에 따른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이 증가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고,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던 국내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더욱 확장시키고 공고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나영 : 저는 경제적인 면은 아니지만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중국의 성장과 세계 3 위의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선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일제시대에 대한 반성하지 않는 태도, 영토분쟁 등을 명백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올바르게 시정토록 해서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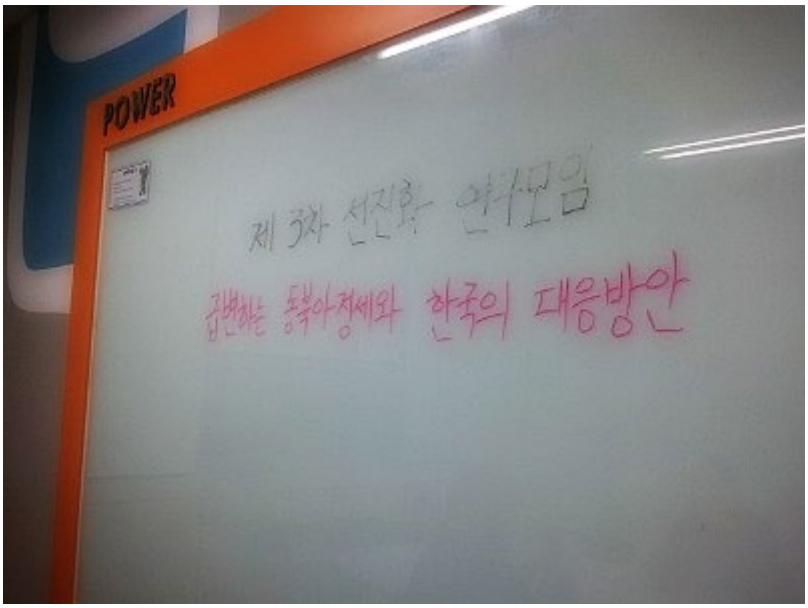
이철우 : 네. 모두들 좋은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주요 선진국들의 지도자들의 교체가 되는 혼란스러운 해입니다. 각국은 각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외교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테고요. 중국과 미국 두 나라는 역사적, 경제적, 북한 등의 문제로 인해 더욱 면밀히 살피고, 분석하여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새로운 정부가 국제관계 속에서 당당히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생존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⑫ 경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지난 11 월 5 일, 경기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 학생들은 '급변하는 동북아정세, 한국의 대응전략은?'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커져가는 중국의 세력과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북한과의 통일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각국 지도자가 바뀌고 그에 따른 정치체제가 개편되며 국제 정세의 변화는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과 긴밀한 외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북한과의 통일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20 대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강성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 그리고 북한과의 통일문제에 대한 경기대학교 연구모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정해경(국관 2) : 지금부터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할게.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까 잠시 월례토론회 영상을 보았잖아. 영상을 봤듯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한국의 대응전략은?'이라는 것이야. 사실 범위도 너무 넓고, 우리가 국제관계학도이기는 하지만,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다보니까 어떤 측면을 다루어야 할 지 고민을 해봤어.

그러다가 가장 핫 이슈인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통일문제를 다뤄보려고 해. 먼저 세계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은 너희들도 다 느끼고 있을 거야. 그렇다면 중국과는 오래 전부터 외교를 맺어 온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외교를 펼쳐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동북아 정세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북한과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먼저 아리부터 의견을 말해줄래? 우리나라가 중국과 앞으로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말해줘.

김아리(국관 2) : 나는 과거 조선시대, 광해군의 중립외교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호의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현재 중국이 경제적인 면에서나 여러 다른 면에서 급성장하고 있고 또, 동북아에서 우리가 중국과 굳이 부정적 외교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전까지 비교적 호의적인 외교를 유지해온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내가 전문 정치인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야한다!'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어느 한 국가에 올인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외교라고 생각해.

정해경(국관 2) : 역시 과거의 역사가 배울점이 참 많은 것 같아. 지은이는 어때?

김지은(국관 2) : 우선, 나는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하는지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 번 되짚어 봤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이나,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도 많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은 그것을 서로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

정해경(국관 2) : 말하자면 서로서로 좋게 하자는, 윈-윈을 말하는 거네?



김지은(국관 2) : 말하자면 그런 것이지~ 또, 중국과 북한은 가끔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 현재 그렇지 않잖아, 북한과의 관계가. 나는 앞으로 몇 년 간은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 현상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기보다는 현 체제라도 잘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중국보다는 북한과의 틀어진 관계부터 회복해야 할 것 같아. 현재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3000' 말이야, 이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데, '북한을 개방시켜서 1 인당 국민소득을 3000 으로 만들어 주겠다. 단, 이것은 북한의 비핵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나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보다 이러한 정책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정해경(국관 2) : '비핵·개방·3000'? 이러한 정책을 목표로 현재 MB 정부가 진행하고 있어? 대북정책을?

김지은(국관 2) : 응, 하고 있지.

정해경(국관 2) :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현재 대북정책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네?

김지은(국관 2) : 내 생각으로는 막 퍼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강경책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김아리(국관 2) : 나도, 개인적으로는 현재 MB 정부의 정책이 뭔가 시원시원해서 좋아. 물론 그 정책의 결과는 따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겠지만, 적어도 질질 끄는 정책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이 나은 것 같아. 하지만 융통성 없이 국민의 소리를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은 조금 보기 불편한 건 사실이야.

정해경(국관 2) : 어떤 면을 통해서 융통성이 없다는 것 같아?

김아리(국관 2) : 예를 들면 4 대강을 엄청 밀어붙였잖아, 그것의 성공여부를 떠나 추진력이 있는 것은 좋은데, 한창 국민들이 반대하고 시위하면서 다친 사람도 많고, 또 광우병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면에서 볼 수 있어 또 'KTX 민영화'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사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도자로서 부족한 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정해경(국관 2) : 그렇구나, 어찌되었든 MB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의 햇볕정책보다는 낫다는 거야?

김아리(국관 2) : 응.

정해경(국관 2) : 그래, 알겠어. 슬아는 어떻게 생각해?

윤슬아(국관 2) : 나는 일단, 중국, 북한, 우리나라 사이에서 무슨 사건이 생길 경우에 보통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북한에게 우호적인 면을 보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의견이 살짝 도발적일 수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탐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북한은 아직 개방이 덜 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들을 식민지? 비슷하게 생각하고 일부러 잘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MB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어찌되었든 일관된다는 점? 예를 들면,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에서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에게 함부로 덤비지마라(?)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좀 잘한 것 같아.

정해경(국관 2) : 그렇구나, 사실 나는 너희들이 대북정책에 관련해서 MB 정부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음, 그럼 기현이 의견을 들어볼까?

박기현(국관 2) : 나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봤어, 중국이 어쨌든 자료에 나와 있듯이 북한을 원조해주는 가장 큰 국가로 나와 있잖아. 그리고 현재 중국 내부 흐름을 보면, 시진핑이 주석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에 맞는 정부가 수립을 할텐데, 내가 알기로는 시진핑이 후진타오의 계열(?)이라고 들었어. 이런 걸 보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외교가 크게 악화될 것 같지는 않아. 북한, 중국, 모두 정권이 바뀌어서 관계가 악화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두 국가의 관계는 차후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에 따라 변할 것 같아. 이전에 중국에서는 MB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책인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대, 거기다가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키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었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북과 대미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세울 것 같아.

정해경(국관 2) : 그러니까 네 말은 '차기 정부의 대미, 대북정책에 따라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이지?

박기현(국관 2) : 그렇지, 만약 우리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에 대해 강경책 위주의 정책을 핀다면, 중국도 계속해서 우리를 안 좋게 바라보겠지.

정해경(국관 2) : 그렇구나, 그러면 현 MB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리 옳지만은 않다는 거야?

박기현(국관 2) : '옳지 않다'라기 보다는 MB 정부 이전의 10 년 간의 대북정책이 나는 이전에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질질 끌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물론 MB 정부의 강경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북한에게 어느 정도 어필한 것도 좋지만, 그 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펼쳤던 대북정책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

정해경(국관 2) : 그래, 알겠어. 그럼 이러한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서 너희들은 차후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이 어떤 식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어? 강경? 회유?

박기현(국관 2) : 나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으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자살율도 1 위였지만 이렇게 평화통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김지은(국관 2) : 나는 좀 달라, 왜냐면 북한은 여태 우리가 지원해준 것을 그냥 이용하는 것 같아서 강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정해경(국관 2) : 식량지원을 핵개발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야?

김지은(국관 2) : 응,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북한과의 신뢰도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회유만으로는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정해경(국관 2) : 그래, 알겠어. 슬아는?

윤슬아(국관 2) : 음, 나는 강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어쨌든 중국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권(?)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류가 지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섣불리 북한에 대한 영향을 키우는 것도 무리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북한에 대해 우리도 영향력을 쥐어야 하지 않나 싶어.

정해경(국관 2) : 강경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은 MB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으로 보고 있는걸?



윤슬아(국관 2) :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부든 각자 자기만의 대북정책 스타일이 있잖아, 어떤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한다고 하고, 어떤 대통령은 강경책을 한다고 하고..... 사실, 이렇게 매 정부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을 바꾸는 것이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헷갈리기만 한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는 초정부적인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정부산하에 있는 통일부가 같은 것이 아니라 아예 독립되고 전문적인 기관을 만드는 것이지.

정해경(국관 2) : 오, 꽤 참신한 의견인 것 같아. 물론 위험한 의견이기도 하지만..^^아리는 왜 강경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김아리(국관 2) : 나는 평화통일은 어렵다고 생각해. 어찌되었든, 이상적인 통일은 민주주의 국가로 흡수해야 하는 건데, 회유만 해서는 계속 흐지부지가 될 것 같아.

박기현(국관 2) : 그것도 맞는 말인데, 흡수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내부체제가 먼저 무너져야 해. 그 나라 국민들이 먼저 발 벗고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은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것이지. 그렇게 되려면 강경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기에 햇볕정책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다른 쪽으로 변질되어서 쓰였는지를 떠나서, 우리가 쌀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렇게 했잖아. 북한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남한에서 줬다고 하는지, 자기 정부가 마련했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남한에서 들여온다는 것을 안다면, 북한 국민들도 '아, 남한에서 주는 쌀이구나, 남한은 이렇게 다는 나라를 도울 수가 있는 나라구나.'라고 생각 할 거 아니야. 최근 탈북민도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강경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정해경(국관 2) : 결국 강경과 회유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겠구나. 중국과의 외교도 그렇고 북한과의 통일문제도 그렇고 차기 정부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어.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나눠줘서 고맙구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칠게.

선진화 과제 7: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 94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김다혜(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최근 중국의 급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 외교 마찰,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과 남북 관계 경색 등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외교적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23 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제 9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토론회 '좌장'에는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는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 대학원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 센터장,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 위원,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 대학원장은 '한·중 전략적 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한중관계 기본 목표와 방향인 내실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박근혜 정부는 기존 관계의 내실화에 주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확대, 다자관계 내의 안정적 한중관계 구축,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 센터장은 '한·일 관계 현황 평가 및 전망' 주제 발표에서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작 한일 양국은 서로를 비판할 뿐 쉽사리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부정적 현실을 지적하고 한 · 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 위원은 '한반도 주변 정세 현황과 함의: 한미관계 중심' 주제 발표에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시점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견제해서는 안 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한 주변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 관계'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경제 개선 동향과 남북 관계에서는 북한에서는 경제 이슈가 절대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북 교류·협력 역시 단순히 경제 차원에서만 시도되어서는 안되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은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틀 내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것과 북한의 "선군"정치가 "선경"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드(THAAD) 배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참여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와 중 · 일, 미 · 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일본의 발 빠른 움직임, 핵무기로 우리나라와 주변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놓고 볼 때 더 이상 "눈치 외교"의 시대가 아닌 주동적, 능동적인 자세의 외교가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한 · 중 양국의 관계는 주변 국제질서, 다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하지만 한미, 중미, 중북, 미일 등 주변 역학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국의 고유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적인 의지를 정확하고 강하게 보여주고, 중국이 인지하는 한 · 미 동맹관계의 강도와 범위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보이고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한중 양국간 상호 교류를 통해 청년리더 양성

또한 다양한 민간 교류를 통해 건실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겠죠. 중국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국의 상호 유학생 육성 관리를 통해 보다 넓은 안목을 지닌 청년리더들이 미래 양국 관계의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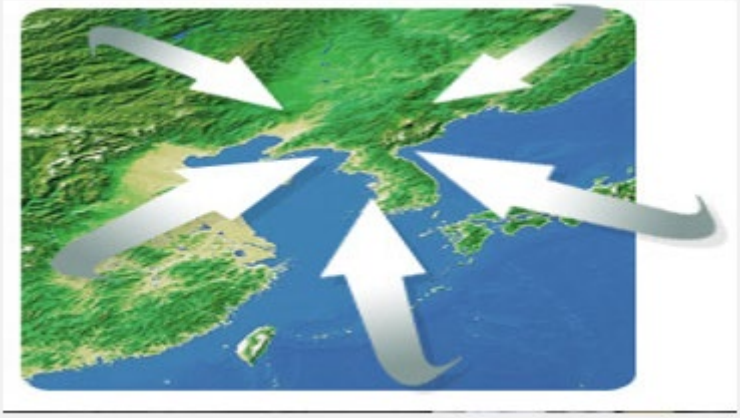
몇 년 전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중국이 “단오제”는 중국의 고유 명절이라고 우겨서 논란이 됐죠. 이와 같은 사례는 한중 간의 인문 교류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인문 교류를 통해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나라를 중국의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중국인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중관계 지속 발전은 급변하는 주변정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한중관계의 전략적 협력 내실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오늘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을 하고 양국의 청년들이 자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김수빈(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국은 강대국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한반도는 예로부터 끊임없이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아 왔고, 내전의 희생양이 되는 등 조그만 영토에 비해 주위 강대국들에게 끊임없이 영향 받아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외교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최근 사드(THAAD)와 관련해 국내, 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아베 정부의 신사 참배 등 역사관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주위 국가들의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이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제 94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의 제 94차 월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은 한중 관계의 내실화와 평화안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력, 다자관계 속의 한중관계를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과 안보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중국에게는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간 분야 교류협력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 연구센터 센터장은 한일관계의 현황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는 국제사회 내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스처 폴리틱스(gesture politics)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역사 문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미관계의 측면에서는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이 한미동맹의 강화를 역설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다자안보체제 등을 통한 상호 신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한, 중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미국에 단호히 알려야 합니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위협 등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을 언급하며 대북관계의 측면에서는 경제체제 전환이 중요하지만 이를 경제의 차원만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강력한 국가들 사이에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외교를 펼쳐야 할까요? 그 핵심은 '소통'과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정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출처: 서울신문)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 문제는 독립 후에도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 또한 각자의 입장과 정확한 요구사항, 책임 추궁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상의 부정확한 정보의 유포부터 시작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소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제는 민간기관과 정부, 야당과 여당이 서로 소통하여 정확한 외교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consensus)를 만들어 일본과의 외교에 제시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다른 국가들과도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혼란스러운 정세를 오히려 우리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③ 김승찬(동아대학교 경영학과)



한반도 주변 상황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100 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4 개의 세력이 있었다. 청, 러시아, 일본, 미국이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넣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 경쟁에서 대한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렇게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로부터 100 년이 지난 현재 100 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어쩌면 100 년 전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 어떠한 행동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북한, G2 에 등극해버린 중국,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러시아, 우경화의 끝을 달려가는 일본, 아시아에서 중국과 경쟁중인 미국이 이웃이며 100 년 전보다 더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북한 예외)을 갖추어버렸다.

우리나라도 100 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성장했지만 다른 국가도 크게 성장했기에 실질 국력의 차이는 100 년 전이랑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런 이웃을 둔 상태에서 100 년 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대한민국은 외교를 잘해야 생존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외교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제 94 차 월례토론회에서 (재)한국선진화포럼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를 다루었으며 참여하신 외교 전문가분들은 한중, 한미, 한일, 남북이라는 양자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적 논의를 하였다.

한중 관계에 대해 논의한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은 현 민간교류의 한계점과 한중관계에 있어 한국이 조급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한중관계를 다룰 때 중미관계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게다가 외적인 관계보다 내적인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관계에 대해 논의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 연구 센터장은 양 정부 모두 서로를 비판할 뿐 구체적인 노력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이것이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과거청산에 대한 보다 확실한 입장표명을 못해 일본에서도 '명확히 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였다.

한미관계에 대해 논의한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미갈등이 벌어질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한미동맹을 튼실히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북관계에 대해 논의한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은 체제는 안착에 성공하였으며 정상적인 사고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대일수록 원칙을 갖고 상대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게다가 북한을 상대할 때 경제적으로만 접근해선 안 되며 복합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반도 주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 토론회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문구는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의 “한국을 찾는 600 만 명의 관광객보단 다시 찾는 500 명의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발언이다. 이는 지속적인 민간교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2 년 전 한국을 방문한 헝가리 친구와 함께 순천으로 여행을 간 일이 있었다. 여행을 하면서 헝가리에서 온 친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에서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힌트를 얻었다. 그때 얻은 그 힌트와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의 의견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



비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청년들과의 자유로운 대화가 큰 힌트다.

청년 때부터 다른 국가의 청년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친구가 되고 그러한 대화가 전세계로 퍼져나가면 서로 서로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퍼져있기 때문에 싸움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2 년 전 생각이지만 설익은 생각이다. 이 생각을 좀 더 보완을 하면 이렇다.

지속적인 국제민간교류를 청년 때부터 활성화하고 청년 때부터 국제적인 인맥을 쌓아 두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때 국제적인 인맥을 활용하여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력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지금의 생각이다.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은 한 번 방문한 사람이 다시 찾아와야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즉 민간교류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민간교류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 방문객이 다시 한국에 찾아 와주어야 한다.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첫 째 외국인들이 다시 찾아올만한 유, 무형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흥미가 없거나 이익이 안되면 다시 찾지 않는다. 이는 국제교류도 똑같다. 어플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인기가 유지되듯 국제교류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유무형의 콘텐츠가 받쳐주어야 한다.

콘텐츠 : 비즈니스, 관광, 산업, 학술교류등 전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sns 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류도 있지만 오프라인을 통한 교류가 포함되어야 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교통비라는 큰 장벽이 청년들간의 교류를 막고 있다. 영현대와 같은 글로벌 대학생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거나 외국의 학생을 대한민국으로 유치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민간교류를 통해 얻은 자원이 대한민국에서 최대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골고루 순환시켜야 한다. 자원의 흐름이 한쪽으로 집중되거나 외부로 빠져나가게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 활성화한 민간교류가 의미가 없게 된다.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

한반도와 같은 국제적인 각축장은 외교에서 고립되면 위험을 초래하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간관계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민간관계도 함께 다루어야 정부 간의 문제에서 마찰이 생겨도 우회해서 해결하는 루트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관계의 활성화가

한반도의 안전에 큰 도움을 준다.



국제외교전은 룰이 없는 무대다.

국제외교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룰이 없는 무대다. 이러한 무대에서 버티지 못하면 나라에 큰 불행을 가져다 주고, 버틴다 하더라도 순간 방심하거나 오판을 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이미 우리민족은 이와 관련된 좋지 않은 경험을 병자호란과 구한말에 겪어보았다.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힘을 키워야 하며 그 힘을 키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보이지 않은 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보이지 않은 손이 한반도의 숨겨진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④ 김지용(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한국 주변국들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세가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새롭게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우경화, 지속되고 있는 한일 외교적 마찰과 북핵 문제로 인한 남북 관계 악화 등 많은 외교적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과 일본과의 청산되지 않은 과거 문제들로 인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가 아닌 활발한 민간 교류로

인한 내실화된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외교적 실리와 안보,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적절한 외교노선을 설정하고 고도의 국가관계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재)한국선진화포럼은 4 월 23 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제 9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토론 패널들로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은 '한·중 전략적 협력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한중관계의 내실화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관계 현황 평가 및 전망' 주제 발표에서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서로의 비판만 제기하고 있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하루빨리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주변 정세 현황과 함의: 한미관계 중심' 주제 발표에서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및 강화는 필수요소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에서 대북 교류는 단순히 경제차원에서만 그치지 말고,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틀 내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중 관계의 내실화는 한국의 외교노선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의 가장 큰 화두는 한중관계입니다. 현 정부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중적 외교노선을 선택하는 것도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보적 실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강대국, 중국과의 협력 관계는 한국의 외교노선에서 취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외교 관계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내실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 가장 필요한 외교 전략입니다.



로얄마케팅으로 중국 시장 내 한국 상품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한다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속에서 그 지위를 명확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을 갖추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은 한국만의 장점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국 시장의 상위 계층을 공략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농식품 분야의 중국 시장 진출은 이러한 로얄마케팅의 성공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자국의 먹거리에 대해 불신이 큰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유기농 식품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중국 시장 내에서 한국의 상품은 고급 식품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의 한국 상품도 이와 같이 중국 시장 내에서 고급 상품으로써 어필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로얄마케팅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과 긴밀한 문화적 연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문화적 교류를 이루어왔다.

오랜 시간 동안 한자 문화, 유교 문화 등을 서로 공유해왔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인의 정서를 다른 나라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인의 문화적 정서에 알맞은 컨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문화 정서에 대해 파악하려 노력하고 이에 알맞은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 컨텐츠들을 제작하여 수출한다면 매우 성공적인 민간 교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활발한 민간 교류를 통한 중국과의 내실화된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 관계 만큼이나 긴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한국의 전략적 탈출구는 이러한 민간 교류들을 통한 국가들 간의 내실화된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⑤ 김한준(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제94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주도의 AIIB(Asian Infrainstructure Investment Bank)출범과 미국의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배치에 따른 미, 중의 상호견제,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우경화로 동북아의 외교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THAAD 도입과 중국 주도의 AIIB 가입 속에서 줄타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미, 중 양국과의 외교관계가 동시에 약화되었고,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한일 관계 경색으로 오히려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대화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일을 향한 길목 또한 험난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외교, 안보적 위기 속에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외교, 안보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제 94 차 월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장은 한중관계에 있어서 원칙을 중요시하되 무조건 꼿꼿한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을 강조하였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주변국과의 역학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최근 한일관계 악화 속에서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베 정부의 대한민국 정책에 대해 보다 냉정한 평가와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 공존 및 통일을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강화의 필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고, 특히 THAAD 배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중국, 러시아를 설득하고, 한미일 안보국방군사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통일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셨고, 한반도 통일의 현실화를 위해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북한의 체제 전환을 순탄하게 진행하면서, 북한의 시장화 촉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동북아 안보, 외교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기반으로 한 선군정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핵개발로 인해 대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폐쇄경제 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군정치와 폐쇄경제 체제에서 외교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활용하는 것은 대외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에 저는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개방의 문을 넓혀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북한이 시장화를 촉진하고, 개방의 문을 넓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이 시장화를 촉진하고, 경제, 외교 면에서 개방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진출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상품들이 장마당에 많이 팔리도록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제품들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남북이 합작한 제품을 많은 북한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에 따르면 2010 년 3 월부터 북한 내 국영상점에 개성공단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전문언론인 '데일리 NK'에서도 북한의 장마당에서 중국산의 3 배 가격으로 판매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영상점에도 판매가 가능하고, 장마당에서도 팔리고 있다면 많은 북한주민들이 개성공단의 제품을 충분히 접할 수 있지 않나요? 2010 년 '5·24 대북 경제제재조치'로 경제교류가 대폭 줄어들면서 국영상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성공단의 제품을 판매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정권에서 장마당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을 일일이 규제함에 따라 개성공단의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장마당에서 팔리는 개성공단의 제품들은 대부분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몰래 빼돌린 물건들입니다.

수요가 있는데도 장마당에서 팔 수 없도록 규제를 했기 때문에 중국산의 3 배나 되는 가격을 주고 몰래 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개성공단 제품을 사야 하고, 북한의 시장개방 역시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들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선 '5·24 대북 경제제제조치'를 해제하고, 경제교류의 폭을 넓히면서, 개성공단의 제품이 국영상점과 백화점을 시작으로 북한 전역에 있는 장마당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⑥ 박소정(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여부 논쟁,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개최와 미국과 일본의 우경화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외교 논쟁. 모두 기억하고 계시나요?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한일 외교 마찰과 남북관계 경색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여러 외교문제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우리를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방향성과,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대외정책의 방향과 구체적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제 94 차 월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과 관련한 전문가 네 분이 참석하여, 한반도와 각 국가와의 관계에서 한국이 가져야 할 방향성과,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제94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한중 관계 전문가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 대학원장은, 현재 한국의 시점에서,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각 국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칙' 있는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다자관계 내의 안정적 한중관계의 구축, 민간 교류의 건실한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 전문가 김창수 의원은 북한을 둘러싸고 한반도에 여러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 시점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견제하게 된다면, 안보에 큰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시며,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동맹 유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 연구 센터장은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현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노력보다는,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이어지는 핵 도발은 남북 간의 긴장을 위한 선전선동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는 북한이 전쟁에 대해 두려워하기에, 전쟁에 대한 위협을 회피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김중호 연구위원은 우리의 대북 협력이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리는 현재, 급변하는 한반도의 외교 정세 속에서, 보다 '원칙'이 중시되는 유연한 외교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으며, 북한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리적 요충지로, 한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제정치적 변화를 제대로 살피고, 동아시아를 이끌어나갈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의 요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참여 여부 논쟁은 '원칙'이 불분명했던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틈에서, 한국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한국 사람들이 곳곳에서 낸 목소리마저, 한국의 '원칙'을 반영한 주체적인 의견이 아니라 '눈치 보기'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는 했습니다.

지나친 눈치 보기로 인해, 한미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AIIB 에서 투자를 선점할 적절한 시기도 놓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이렇게 '원칙'이 없는 외교를 계속한다면, 세계적으로 우리의 국가적 이미지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국이 함께 참여해서 상호작용하는 국제정치에서 우리만의 원칙,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만의 주체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우리의 구체적 외교 정책에도 우선성과 주체성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여론조사나 전화 설문 등을 뛰어넘어 정부와 국민들 간의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는 대화의 장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한국은 지금 급변하는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원칙을 공고히 하고, 그 원칙에 기반해, 상황에 따라 우리의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시키며 여러 외교적 변화에 대처해

나갈 때, 우리도 곧 이 소용돌이에서 나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세계 속에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⑦ 박재형(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우리나라는 지리상 많은 외세침략을 받았다

현재 한반도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과 더불어 중국, 미국, 일본 등의 강대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위치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항상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주시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주변국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며 우리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토론해보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제 94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은 한중관계 기본 목표와 방향으로서의 내실화를 꾀하는데 있어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신임 주중대사는 꼿꼿함 보다는 원칙있는 유연성을 갖추길 조언했고, 다자관계 내의 안정적 한중관계 구축,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작 한일 양국은 서로를 비판할 뿐 쉽사리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부정적 현실을 지적하며 한일간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습니다.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역내 긴장의 고조 속에서 한국 안보를 강조하며 현 시점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견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및 강화는 필수요소 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개선 동향과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에서는 경제 이슈가 절대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대북 교류·협력 역시 단순히 경제차원에서만 시도되어서는 안되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은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틀 내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반도는 지리상 교두보 역할로 인해 중국과 일본에게 과거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으며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침략에 맞서 때로는 강하게 또는 회유책으로 국가를 보존해왔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침략에 불구하고 나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과 외교에 있어 서희의 외교담판을 교훈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희는 현명한 외교술로 적의 영토요구에 불구하고 오히려 이이제이의 실현과 강동 6 주를 되찾으며 실리외교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외교가 가능했던 이유는 상대국의 목적을 잘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소손녕과의 담판에서 실리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이러한 서희의 외교담판을 교훈삼아 우리나라도 외교에 있어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고 무엇이 더욱 국가에 이득이 되는 것인가를 파악하여 외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교해야 끌려다니지 않는 외교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외교는 우리나라에 최대한 이득이 되는 외교 즉 실리외교에 답이 있으며, 이러한 실리외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목적과 우리나라에 오는 손익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하며 필요할땐 강하게 또는 유연하게 대처할줄 아는 외교의 강약이 있어야 합니다.

⑧ 박현진(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점점 개선 되어가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본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및 관계 개선인데요. 대한민국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불리는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보여 점점 외교관계 속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한국선진화포럼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제 94 차 월례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각 토론자분들은 중국, 미국, 일본, 북한과의 외교관계 현황과 대처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요.

먼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 연구 센터장은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별로 원하지는 않지만, 국제관계 정당성을 위한 제스처를 충분히 취하고 있다고 보고 대한민국도 이러한 제스처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자간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드(THAAD)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은 사드(THAAD) 배치는 안보적 측면에서 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할 부분이고, 중국과는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과 함께 경제적 협력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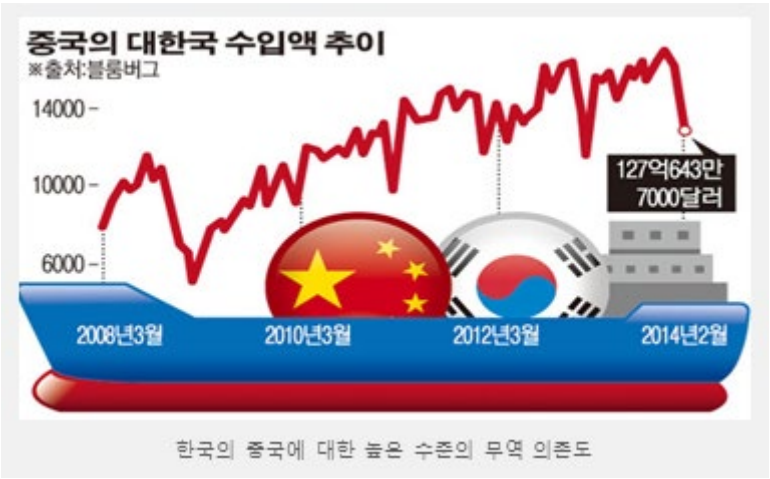


사거리 300km~3,500km 정도의 탄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THAAD)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현재까지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보이는 외교전략을 통하여, 미국과 중국 양국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미국이 한중관계를 의식하게 만들어, 오히려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중국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모호한 입장을 내세움에 따라 오히려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처럼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전략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전략적 확실성'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무역 의존도

중국에게는 미국과 안보적 전략노선을 함께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드(THAAD) 배치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튼튼한 안보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되, 경제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안보전략 수립을 위한 대화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협력관계는 분명히 필수적인 경제적 협력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확실한 입장을 전달한 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이룩하게 될 한반도 평화

이에 더불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꾸준한 대화를 시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다자간의 북한 비핵화 문제를 이끌어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확실성'에 입각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⑨ 백송희(단국대학교 무역학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는 물론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외교 안보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 외교 마찰,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 등의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불통하는 외톨이가 되어 러시아가 내민 손도 쳐냈을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적극적인 제스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호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 결국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국제적인 외톨이가 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생존과 직결된 국가 안전의 도모와 국익의 보장을 위해 어떠한 외교적 대응과 전략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생존 전략의 강구를 위해 지난 23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고도의 외교적 대응과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 9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하는 94차 월례토론회가 열렸다.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은 역대 정부는 전 정부 대비 한중관계 격상과 과시 욕구가 강했는데 비교적 박근혜 정부는 기존 관계의 내실화에 주목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원칙있는 유연성과 다자관계 내의 안정적 한중관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부정적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였습니다.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안보의 최고 우선순위는 여전히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및 억제에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 증대, 체제의 불안 정성과 예측 불가성, 급변 사태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 시점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견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종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개발이 상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위협은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은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틀 내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동북아 협력을 통해 강대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자면 국가안전의 도모와 국익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원적인 시각으로 세계의 정세를 살피되, 체계적인 틀 아래 일관된 외교 노선을 갖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으며 북한과 한 나라에서 분단된 만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은, 동아시아 관계를 이끌어 나갈 지리적 요충지에 해당합니다. 허나 경직된 한.일 관계는 과거사에 얽매여 좀처럼 풀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한.일 관계의 경직은 동북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일 모두 80% 이상이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상찮은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동북아 한.일 관계의 새 판을 짜야만이 미.일-중.일 친화로 변화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고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일 감정 악화의 원인을 파헤쳐보면 그 속에는 과거사에 대한 수모와 이에 대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지나치게 역사에 집착하는 모습은 한미관계와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강대국이 된 지금,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실의 직시를 통한 한.일 외교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 될 것이 아니라 조건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실현할 때, 일본 역시 우호적인 관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 역시 국내정치에 발목이 잡혀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과거사에 지나치게 얽매여 상호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지금 이러한 민감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업계는 국제 정치 교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알려야 하고 나아가 전국을 넘어 전 세계의 대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의 지도자들인 대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소통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장을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만들어 미래에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때 경제 보안 및 외교 분야에서도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소통해야합니다. 과거사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혼란스러운 대외 정세 속에 결국 동정을 넘어 우려를 사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는 소통해야합니다. 유연한 사고와 대외정책을 통해 혼란을 헤쳐 나가고 이 위기를 발판으로 더욱더 강해진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국가가 되어야겠습니다.

⑩ 송민상(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한국 외교는 분단과 강대국간 세력대결을 해결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있다.

최근 한국의 싸드(THAAD)배치와 AIIB 가입 문제 등을 놓고 미·중간 힘겨루기 싸움을 벌인 양상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시 한국의 사전 동의 여부나 북한의 상시적인 핵 도발, 러시아의 승전 기념식 참여 여부 등을 놓고도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일까요? 한국은 비슷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타의 국가들과는 달리 현존하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각축장으로서 대외 정세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개최된 중일 간 양자회담은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대요. 이러한 대외적 환경을 과연 위기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위기에 강한 나라로 묘사되는 한국답게 슬기롭게 기회로 전환시켜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재)한국선진화포럼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제 94 차 월례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각 발제자께서는 한중, 한미, 한일, 남북이라는 양자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적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은 역대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가 외교적 과시보다 기존 관계의 내실화에 주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확대, 다자관계 내의 안정적 한중관계 구축,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일관계에 대해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 연구 센터장은 한일 관계의 악화가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서로를 비판할 뿐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노력에 나서지 않는 현실을 지적해 주시며, 한일외교문제가 국내정치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섣부른 정치적 결단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미관계에 있어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및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시며,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 증대, 체제의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성,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 시점에서는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견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에 관해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전쟁 수행 능력의 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이 핵전쟁을 언급하며 긴장 수준을 고조시킨 것은 북한의 선전선동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선제적 위협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더불어 북한에서는 경제 이슈가 절대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대북 교류·협력 역시 단순히 경제차원에서만 시도되어서는 안 되며, 대북 접근법은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틀 내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대외적 위기를 강대국으로 넘어서는 기회로 이용하자.

결론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종합하여 생각해볼 때 강대국의 아시아 외교 각축장으로서의 한국과 분단의 특수성을 안고 있는 한국이 처한 대외적 위기를 슬기롭게 기회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고도의 전략적인 외교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역대 정권이 펼친 어설픈 중립 외교의 시도는 실패로 귀결된 경험을 통해 볼 때 전략이 부재된 근시안적이고 이상향적인 외교적 접근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의 교체에 따른 외교적 동맹의 급변보다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과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일관된 외교적 행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국제질서에 철저히 편입한 행위자로서의 한국의 사고와 자주국가를 표방하며 국제질서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북한의 외교 접근법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유념하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화 시대,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 속에서 한국은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며, 미중의 패권이 맞물리는 新국제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를 위해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 조심스러운 정세를 고려하여 비공식적인 민간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네트워크 외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진의 전달과 양측의 교류 활성화가 결정적인 분기점(critical juncture)에 우리의 국익을 지켜줄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⑪ 송소담(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소통부족으로 인한 한일 갈등심화,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과 남북 간 소통부진 등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따라서 우리가 외교 안보적으로 고립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국익을 지켜야만 하는 입장인데요.

이에 지난 23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도의 외교적 대응과 전략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제 9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선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양국 정상의 리더십이 여론의 악화를 거슬러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없고 여론상황도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 간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및 강화는 필수요소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우리의 대북 접근법은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틀 내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임 중국대사는 꼿꼿함보다는 원칙 있는 유연성을 갖추길 조언하면서 다자관계 내의 안정적인 한중관계 구축과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중관계,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할까요?

최근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한중관계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한중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한중관계는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진행해왔던 것들을 다지고 확립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내실화'에 주목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략적으로도 다자관계 내에서 사안별로 상호연계의 강약을 지혜롭게 선택해나가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긍정적인 한중관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한중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중관계에 대한 전략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민간차원의 관계발전이 순조롭고 건강하지 못하면 한중관계가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건전하게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중관광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통한 한중관계 수립

이에 우리는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에 집중하여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한중관계를 다져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쌍방향적이고 국민 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 '한중 관광정책의 체계적 수립 관리', '인문교류위원회의 체계적 운용'을 통하여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한국과 중국은 '한중드라마 공동제작이나 한중다큐 공동제작' 등을 통하여 양국민이 정서적으로 유대를 가질 수 있는 '문화'적인 교류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는 한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나라의 인기배우를 활용함으로써 '문화적 교류'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에 관광을 오는 중국관광객이 많아진 현재, 이제는 관광객을 늘리는 양적확대가 아닌, 이미 다녀간 관광객들 중 한국을 다시 찾는 인원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관광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한국은 좋은 나라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한중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에 16 개 국가를 대상으로 가장 관광을 하고 싶은 나라를 조사한 결과, 1 위가 일본인 반면, 우리는 14 위에 머물렀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관광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문교류위원회의 운용에 있어서 정부, 민간, 반관반민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체계적인 운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올해 제주도와 중국의 하이난성은 인문유대 강화사업을 통하여 테마도시사업 진행은 물론, 양 국가를 각 지역의 문화 및 스포츠 행사에 상호 초청하여 다양하게 인문교류를 확대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 또한 한중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한중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최근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한중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발전'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한중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 민간, 반관반민이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쌍방향적이고 국민 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 '한중 관광정책의 체계적 수립 관리', '인문교류위원회의 체계적 운용' 실시를 통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⑫ 윤수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록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아직까지 명실상부 글로벌 슈퍼파워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외쳤고, 아직까지 강대국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 역시 유라시아주의에 기반, 신동방 정책을 통해 아시아로의 관심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역내 분위기를 가장 들썩이게 만들며 새로운 글로벌 파워로 도약중인 중국의 경우 신(新) 실크로드의 회복을 주창하며 이를 위해 일대일로 사업을 비롯, 아시아 곳곳에 영향력을 넓히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경제회복과 더불어 아시아 역내의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노력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94차 월례토론회가 열렸다.

이런 상황은 결국 한국에게 있어 외교적으로나 국내정치적으로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내재한 국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이번 제 94 차 월례토론회에서 (재)한국선진화 포럼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한중, 한미, 한일, 남북이라는 양자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적 조언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한중관계 전문가인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은 한중관계의 진전 성과에 대한 과시욕구가 강했던 역대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기존 관계의 내실화에 주목한 점을 긍정적으로 꼽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확대가 필요한 만큼 여타 국가들과의 다자관계 내에서 안정적인 한중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교류 부문 또한 확대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신임 주중대사의, 원칙에 기반하되 유연성 있는 접근법과 대처를 보여줄 수 있길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 연구 센터장이,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지만 양 정부 모두 서로를 비판할 뿐 구체적인 노력에 나서지 않아 결국 이것이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었는데요.

특히 한일 외교문제가 단순 국제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만큼 양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도 민간교류의 활성화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신경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미관계의 경우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정책 조언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특히 김 연구위원님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쌓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튼실히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더욱 더 보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눈치만 보며 명분만 따지기 보다는 실리를 위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도발의 점진적인 증가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급변사태들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현존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 협력 관계와 한미동맹을 상치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잘못된 견제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날카로운 시각의 분석을 더해주셨는데요. 특히 북한의 핵 도발은 사실상 남북관계의 긴장 수준을 고조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의 최극단 지점을 의미함 결국 이를 뒤집어 해석해 보면 전쟁까지로의 연결이 두려워 북한이 그를 회피하기 위해 선택한 선제적 위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 트랙(Two-Track) 전략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와 정치를 거의 동일시하며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상기하면서,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 틀 안에 북한 시장 경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본다면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강대국들 사이의 외교적 이권 다툼의 각축장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은 현재 분단이라는 크나큰 패널티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히 국제사회의 선진국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으로 신뢰성과 영향력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냉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에 따라 명확한 외교노선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보다 현명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원칙은 명확히 하되 일관된 주장으로 신뢰성을 획득하고, 특히 타협 가능한 부분에서는 실리를 따져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고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사드(THAAD)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 사이에서 겪었던 한국의 내적갈등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거대한 중국 경제권을 활용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서로 상충된다는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어느 한 쪽을 명확히 지지하지도, 그렇다고 둘 다 동시에 수용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였지요.

그 결과 미국과의 굳건한 안보 동맹, 그리고 AIIB 라는 거대한 신 성장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보기 좋게 놓칠 뻔 했습니다. 특히 AIIB 의 경우 결국 가입을 하기는 했지만 시기가 늦어져 알짜배기 투자 요소들은 이미 다 놓쳐버린 실효성 없는 가입만 남은게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할뿐더러 우리 스스로의 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인 만큼 명분상으로도 배치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함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쓰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한미 동맹관계에 괜히 어색한 기류만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두 관계 사이에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느 부분까지가 한미 동맹에 있어 불안 요소이고 어느 부분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해야 그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진단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발 빠르게 사드배치와 AIIB 가입을 동시에 처리하고 한미동맹, 중국

신시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완벽하게 잡았을 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진단에 따른 명확한 외교노선으로 정책 골든타임을 살려야 한다.

21 세기 안보환경은 너무나도 많은 다자 협력관계가 얽혀 있어 그것을 일일이 다 풀어내기란 어려울뿐더러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는 외교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런 것을 눈치만 보고 있다가는 외교정책이 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기 마련입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명확히 진단해 내고 그에 맞는 원칙과 양보 가능한 수준을 명확히 한 범주 내에 유연적인 사고로 체계적인 외교접근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만,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을 잘 해쳐나갈 수 있는 한국만의 선진 외교정책을 건실히 수립해 나갈 수 있음을 항상 상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⑬ 이윤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외교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AIIB 가입 등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실리를 잃어버린 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과 얽힌 이해관계가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정세를 읽어내고 적절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리 추구를 위해 행동하되, 원만한 외교를 위해서는 공공외교로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를 해나가야 합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 9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은 한중관계에 있어서 역대 정부는 한중관계 격상 과시 욕구가 강했는데 비교적 현 정부는 기존 관계의 내실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신임 주중대사는 꼿꼿함 보다는 원칙 있는 유연성을 갖추길 조언하였습니다.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에 의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견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우리의 대북 교류·협력이 단순히 경제차원에서만 시도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틀 내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나 한일 양국은 서로를 비판할 뿐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부정적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일 간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양국 국민들 간의 인식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나 독도 영토권 분쟁과 같이 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민간교류의 측면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보이는 태도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대화의 장을 열고자 노력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측면 역시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미 양국의 감정이 상해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현 시점에서 공공외교를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공외교를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외교는 정부 간 협상이나 소통 같은 전통적인 외교 개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대중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또한 문화 · 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 기재를 활용하여 그들을 감동시키고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 역시 공공외교의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 기업, 지방 자치단체, 정부 기관 등 여러 주체들이 일본 대중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일본과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방식과 관련하여 비유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바람과 햇님'라는 동화를 기억하시나요? 그 동화에서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로 한 내기에서 이긴 것은 누구였나요? 바로 햇님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 바람을 많이 불면 오히려 더 꽁꽁 옷을 싸매지만, 해를 비추었더니 혼자서 옷을 벗었습니다.



'바람과 해님 ' 에서 해님과 같은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일관계의 외교에 있어서 역시 이처럼 발상의 전환을 하여 따뜻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과 등을 돌린채 대화를 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갈등하고 반목할 것이 아니라 공공외교를 통하여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나가는 일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차가운 바람만 불어댄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 햇님의 입장이 되어 문화교류, 민간교류 등을 통하여 감성적이고 따뜻하게 접근할 때, 얼음 같던 한일관계를 녹이고 두 국가 간의 외교관계 역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⑭ 이정진(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지난 4월 23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하에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한반도 사드 (THAAD) 배치, 미국과 일본의 우경화,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개최, AIIB (아시아 투자은행) 확장, 한일외교관계경색 등 국가 간 대외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외정책 방향과 구체적 수립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경우,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존의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미국의 개입으로 한국이 주권을 지키고 외교적, 안보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외교를 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4 월 23 일 한국선진화포럼은 '한반도의 주변 정세 :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 하에 제 94 차 월례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월례토론회에는 한-일 관계 전문가로는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 한-중 관계 전문가로는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한-미 관계 전문가로는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남-북 관계 전문가로는 김중호 한국 수출입은행 선임위원장이 참석하여 한반도의 외교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 진창수 센터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과거사와 같은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섣불리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 차원의 협력에 앞서 민간 차원의 협력이 우선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중 관계 전문가로 참석한 문흥호 대학원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원칙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하여 보다 안정적인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개선 및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관계 전문가 김창수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여전히 체제의 불안정성과 함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미 동맹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안보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븍 관계 전문가 김중호 선임 위원장은 선임연구원은 대북 교류 협력은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정치 및 경제 체제가 변화되도록 국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각 국가 관계 전문가들이 대외적 외교 변화가 한국의 국제 사회 고립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 있는 유연한 외교 정책' 입니다.

'원칙 있는 유연성'이란 기존의 대외 정책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요구하거나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추어 실리를 취하기 위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 있는'입니다. 상황에 맞추려는 유연성이 자칫하면 상황에 휩쓸려 오히려 주체성을 더욱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의 외교적 방향을 수립한 이후 그에 맞추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에게 필요한 외교적 변화 방향은 그럴싸한 명분보다는 경제적, 안보적으로 국가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실리적이고 주체적인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대외 정책은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중국과 대립하며 동북아 어느 국가들보다 적대적인였던 중국과 일본은 지난 4 월 22 일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TPP 에 가입한 일본에게 우호적 태도를 취하며 최근 중국이 주도하는 AIIB 가입에 대하여 권유하였을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 월 28 일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회동을 가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과 함께 TPP 를 이끌어갈 주역이며 올해 UN 70 주년을 기념하여 일본이 UN 안보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무력, 강경한 태도 혹은 협박이 아닌 주체적인 태도를 통하여 자연스레 얻어내면서 기존의 일본이 지닌 태도에 대해서는 큰 노선 변경을 하지 않는 일본의 외교는 명분과 실리 모두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대립하며 다른 외교적 접근책을 찾지 못하여 일본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냉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대립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같은 위치에 서있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중일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한반도 사드 (THAAD) 배치'를 감수하면서 AIIB 가입을 결정하였으나, 뒤이은 일본의 정상회담으로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묻겠다거나 굽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한국만의 외교적 수단을 만들어 외교에 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는 상황에 맞추어, 국가 차원의 협력을 기대하기 보다는 기업 간 협력이나 시민단체 등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식 개선과 함께 경제적 협력으로 이어져 양국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 수립에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시(市)와 시의 협력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다 작은 차원으로 일본의 한 시(市)와 한국의 한 시(市)가 정치적, 문화적 혹은 경제적 교류를 맺음으로써 서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관계만을 신경쓰고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한국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체제 하에서 원칙을 세우고 그 후 다른 나라의 관계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주체적'인 한국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외교는 국가가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것을 내세울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쫓음 혹은 무조건적인 배척은 국제관계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좁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⑮ 정우재(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쟁, 누가 승리할 것인가.

한반도 주변의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한국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G2 를 외치며 '대국굴기'를 꿈꾸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역사문제로 외교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구소련의 패권을 되찾으려는 러시아, 그리고 북한 핵이라는 변수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 정치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대적 흐름과 각 국가들이 처한 상황, 이해관계, 정책목표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철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제 9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및 한중, 한일, 한미, 남북관계 등 한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 방향과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양국의 관계와 갈등 상황을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일미, 미중, 한중, 일중 등 국제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일본에 대한 영향력 내지는 제어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무조건적인 갈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가운데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없으면 따라서 한미동맹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전략은 단순 경제적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가지되 유연성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원칙과 결부된 분명한 입장을 표현하는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하였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꿈'을, 일본은 '정상국가로의 회귀'를 향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드(THAAD) 배치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 문제는 대한민국 외교 능력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첨예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명확한 국가적 목표와 가치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다른 국가의 눈치를 보며 필요 이상의 고민를 했습니다.

물론 국제 관계 속에서는 자국의 주장만을 고집하기 어려우며, 특히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워낙 강대국이며 미국을 포함한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자주성을 내세우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한국과 같은 약한 국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균형자', '전략적 모호성'과 같은 용어들은 강대국의 국제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강대국의 학자들이 만든 것인데, 이를 약한 국가가 사용하게 되면 강한 두 나라 모두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 강대국 중 하나인 미국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고민'이 한국의 자주적 의지가 약한데서 비롯된 것이고, 이런 모습이 다른 나라, 특히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안보 관련 의지와 역량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속 반복한다면 중요한 사안에 부딪칠 때마다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는 한 국가의 의지표현입니다. 한국이 외교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상실하고 타국의 간섭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가적 목표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내건 '중국의 꿈', 일본은 아베 총리가 내건 '정상국가로의 회귀'를 지향점으로 삼아 외교정책을 실행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국가적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은 역사문제와 영토 분쟁 등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각국의 외교적 목표를 위해 손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2 차대전 때 적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가로서 우방 관계와 공통된 목표를 공고히 하면서 한국은 국제 외교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역시 분명한 가치와 국가적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외교적 전략 구도가 이 지향점을 바탕으로 유기성을 가지며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정책을 선택해야할 시점이 올 때마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주체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환하게 빛나기 위해서 자주성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이 처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속 두 국가 중 어떤 국가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어떤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안보는 미국이며, 경제는 중국이기 때문에 둘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제와 안보, 둘 중 어느 하나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균형자' 전략은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아도 되는 강한 국가만이 취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비정상국가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며, 패권추구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독재국가인 중국이 밀착되어 있는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국가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경제력은 바람 앞의 등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에게 안보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에게 안보적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이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쉽게 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중국의 한국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는 것과 중국 역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급한 모습을 보이기보다 중국이 우리에게 다가서기를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보문제 만큼은 미국과 함께 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합니다. 중국이 으름장을 놓는다 한들 도움이 된다면 눈치볼 것 없이 배치해야 합니다. 돈과 목숨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따지는 어리석은 국가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 역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보와 동시에 경제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싸드 배치는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전달하는 동시에 안보 문제 역시 의존 강도와 범위에 있어 자꾸 미국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싸드가 한국 안보상 필요하다면 배치한다는 메시지, AIIB 참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섰다면 참여한다는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표명하고, 자주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며 주체성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나갈 때만이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⑯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부)



최근 아베 일본총리는 미국 하버드대 강연에 이어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도 과거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죄를 외면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못 이겨 과거사를 뉘우치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였지만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데요.

평화헌법으로 전쟁을 하지 못하는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위대의 군사적 행동에 한 층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평화라는 명분으로 군사적 진출을 하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자위대는 2 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되었지만 '치안유지'를 명목으로 경찰예비대를 출범시키면서 자위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보안대, 경비대로 명칭을 바꾸며 1954 년 7 월 1 일에 자위대법에 근거하여 자위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으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일본의 야욕이 언제 어떻게 발현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 많은 부분이 뒤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야욕을 늘 경계하고 주의 해야한다.

일본의 육상자위대의 전력은 비록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해상, 항공 자위대의 전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만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을 6 척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4 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경항공모함으로 불리는 헬기탑재상륙함도 우리나라의 독도함보다 배수량이 크고 보유 대수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조기경보기, 호위함, 최신 레이더 장비 등등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분명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적, 지리적 관계에서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협력적이고 긴밀한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 성장은 일본의 경제성장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은 우리 기업들에게 지금도 커다란 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5 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자동차산업은 초기 일본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일본의 경제성장을 벤치마킹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 자동차기업과 일본 자동차 기업은 다량의 부품의 규격을 획일화하여 공유하고 함께 생산하여 부품 단가를 낮추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는 첨단 전자장비의 연구 및 기술 개발도 함께 협력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한 때 세계를 휩쓴 DVD 플레이어는 브랜드는 우리 브랜드였지만 부품의 84%이상이 일본제 부품을 사용하였고 LCD 모니터에 들어가는 편광필름은 최근까지도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전자산업, 휴대폰제조업 등에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등등의 경제 전반에서 일본은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로 꾸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역사적, 지리적 불편함이 절대로 양국관계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우리는 실리외교를 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중동,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실리외교를 바탕으로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디플레이션을 타계할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중동 방문 중에는 의료, 식품 산업에서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남미 외교에서는 페루의 고등훈련기 사업을 비롯한 한류문화 확산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처럼 국익을 위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움직이는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국위를 선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다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경제지표가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엔저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수출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종신고용, 연공서열을 일본의 전통적인 고용구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미 20 여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역할임금제 등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구조조정의 성과가 청년일자리 창출, 흑자수익으로 최근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외교정책이 보다 실리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적극적인 FDI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가 부강할 때 비로소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활력을 잃은 경제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물가하락과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침체기에 접어드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며 FDI 가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특히 떠오르는 핀테크 분야의 선두를 중국과 유럽 등에 내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낡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산은규제와 같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본의 사과만을 요구하며 일본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 '과거'라는 짐을 우리가 먼저 벗어 던져 내는 것은 어떨까요?

일본에게 과거를 잊지말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키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책자 및 동영상 제작, 민간단체 지원 등등 홍보의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멀지만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의 국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받아들이는 용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⑰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반세기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국민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고 전쟁대비만을 하는 호전적인 봉건왕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것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모든 것을 잃었고 쓸만한 천연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세계 13 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경제대국들과는 달리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과거에 식민지를 착취한 적도 없고 천연자원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쌓아올린 부입니다.

경제력만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군함, 탱크, 전투기까지 못 만드는 것이 없고 독일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세계 7 위의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이 겨우 반세기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조국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과거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정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국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특히 외교방면에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외국에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가 외교 정책을 힘있게 하기 힘듭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바꿀 시간이다.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국내 정치에서 반대편인 정당의 주장일지라도 수용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외교에서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국내 정치로 가지고 오고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국익을 훼손합니다.

AIIB 가입, 전작권 환수 연기, 사드 배치 등의 문제를 결정할 때 너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상대국에 보여주었고 국론이 통일되었을 때보다 이익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상대 정당을 배려하며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 함께 고민함으로써 협의의 정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지금의 정당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하는 쪽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중국, 러시아, 일본이 군사대국화하고 대외팽창을 시도하고 있어 외교, 안보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실리중립외교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아베 정부가 싫다고 일본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아베 정부가 계속해서 과거의 만행들을 부정하고 군국주의 시절의 일본으로 회귀하려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지금의 관계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도를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위안부 문제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나쁜 상태로 지속된다면 이들도 우리의 친구가 아닌 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의 교류를 지금처럼 끊어버린다면 일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과거사 문제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일본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를 확대하면서 일본에서 친한파가 늘어난다면 일본 정부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우리 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현재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면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 경제 2 위, 3 위, 13 위의 대국들이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현존하는 어느 경제공동체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등의 자원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판매국을 압박하고 시베리아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한중일 3 국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근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월했던 과거의 동북아시아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론의 분열을 멈추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로 하루빨리 변모하여 동북아시아 공동체로까지 나아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⑱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광해군 때 조선은 중립외교를 통해 자주적으로 국익을 도모했다.

광해군 때 실시했던 중립외교를 아시나요?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는 과다한 전쟁 비용과 내부 반란으로 국가 전체가 휘청거리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은 강성해져 중국대륙에 새로운 변화가 일었습니다. 이때 후금이 명의 변방을 위협하자 명은 조선의 출병을 요구하였는데요.

광해군을 지지하는 북인 정권은 새롭게 일어서는 후금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정책을 실시하여 전쟁을 피했습니다. 강홍립 도원수로 하여금 출병하게 한 후 정세를 보아 투항하도록 하였지요.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사대주의를 답습하기보다, 실리위주의 등거리 외교를 펴 임진왜란 이후 무너져가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국의 이익을 스스로 취했던 자주(自主)적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주재하는 일은 기본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기본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이 아닌 북한의 존재, 그리고 양옆의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영토 및 역사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호시탐탐 그 영향력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현안과 역사논쟁은 우리에게 불편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제는 광해군 때 실시하였던 자주적 실리외교를 거울로 삼아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방안은 첫째, 역사 논쟁과 현실을 별개로 봄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둘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우선 첫째, 최근 일본의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더욱더 공세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일제의 아픔과 치욕의 역사를 지나온 우리나라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변 국가를 침략하여 약탈한 행위를 국가적 영광의 역사로 여기는 것은 정신분열에 가까운 현실 부정입니다. 인간이라면 식민지 수탈과 전쟁범죄에 대한 수치심과 사죄하는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없지요.

말인즉슨 일본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한 나라의 수장이자 전쟁을 수행한 조상의 손자로서 그런 감정을 대놓고 표현할 수 없는 입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순간 일본 근대사 100 년이 부정되고 국가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점을 계산한 결과이겠지요.

이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일본의 전향적인 사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사 프레임만 가지고 일본을 자극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그 말장난에 일일이 대응할 이유도 없고, 일본의 과거사 발언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준다면 국익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 우리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국면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효율적인 남북관계 개선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질서 만들기에 필요한 미래가치와 추진 의지가 박약합니다. 다른 나라의 눈치만 살피는 버릇이 있어서 그럴까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밀월관계를 드러내고, 글로벌 차원의 리더십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익을 기준으로 자주적인 결정을 한다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가 약하고 아직도 미국, 중국의 이해에 마냥 끌려 다니기에 바쁩니다.

진정한 실리외교는 강대국의 논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자주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 미래가치는 다름 아닌 남북 간 교류협력과 시장경제 활성화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인 남북관계 개선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설령 북한 내부에 급변 사태가 있다고 해도 관계 개선이 지지부진한 현 상태로는 남쪽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촉진하여 문을 여는 것입니다. 80 년대 중국 공산당이 대대적으로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모델로 삼아, 시장경제의 맹아가 북한사회에서 자라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한 정상회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투자를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가 결코 제로섬(zero sum)이 아닌 포지티브섬(positive sum)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성공단부터 활성화시키고 금강산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협력은 결국 남북한 모두가 사는 길이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경분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5.24 제재조치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상회담의 의제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북한 내 경제개발구의 개발, 교역 및 관광을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대기업들은 투자할 곳이 마땅찮아서 10 대 그룹의 사내유보금만 500 조가 쌓여있으며,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매커니즘이 계획경제보다 효율적이고 건설적이라는 사실을 피부에 와 닿게끔, 서서히 깨닫게 해 줄수록 훨씬 유연한 대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는 지난 70 년간 고착화된 분단구조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의 주역이 되는가 들러리가 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평가는, 과거를 두고 우리가 평가를 내리듯 후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쟁범죄를 부인한다면 더 부끄러운 현재의 역사를 남김으로써 일본 자신에게 악수(惡手)가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정, 반을 거쳐 합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과 같은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잊지 않는다면, 진실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미 100 여년 전 열강의 각축으로 촉발된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속에서 국가를 농락당한 아픈 경험은 향후 우리의 행보에 큰 지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냉혹한 국제정치 속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살아남는 길은, 과거사 논쟁과 현실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시장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일입니다.

사진 1: http://study.zum.com/book/17149

⑲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근 아베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의회연설을 하고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핵심변화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본 주변에만 한정돼 있는 미·일동맹의 작전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 일본의 역할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자위대의 지리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면서 패전국으로서 군사적 제약을 받아왔던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미국도 중국견제에 대한 부담을 일부 일본에게 넘겨주어 커다란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면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을 둘러싼 다양한 강대국들의 외교적 전략이 최근 많이 바뀜에 따라 한반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역동적인 외교적 움직임에 한국은 눈치를 보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저 눈치만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급변하는 한국주변정세에서 정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은 곧 주변국가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주변 국가들과 지켜야 할 가치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잘 분석하여 유연한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서 거대한 경제 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경제 3 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광활한 경제영토와 십억 이상의 잠재구매자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과 세계 3 위의 GDP 를 기반으로 선도적인 기술력을 뽐내는 일본을 옆에 두고 있는 한국은 기회의 땅인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군사력 1 위 국가로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군사권에 막강한 파워를 갖고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힘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흐름을 함께 할 동북아시아의 선두주자들과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경제와 안보 모두가 한 국가에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쪽 편만 들지 않는 유연함과 실리를 갖춘 외교를 기반으로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잘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에 도움의 제스처를 펼치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 역시 우호적인 제스처를 풍겨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한 쪽과의 동맹은 반대쪽과의 오해로 이어지는 흑백논리가 작용하는 만큼 이러한 제스처 외교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스처 외교 속에서 한국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유럽연합과 같이 탄탄한 결속력을 지니지 않았고 공통된 통화를 사용하지도 않지만 그런 한계를 넘어 중국과 일본과 공통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동북아시아의 핵심 3 국이 모여 공동으로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프로젝트와 같이 동북아시아 3 국이 합심하여 이에 버금가는 국제적 프로젝트를 실행시킴으로써 외교적 단결을 공고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까우면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 시베리아를 공동 연구/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훌륭한 외교는 국가와의 관계를 급속히 전환시킬 수 있는 파워풀한 장치입니다. 현명한 외교술을 통해 고립되어 있는 한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는 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그림 1) https://www.youtube.com/watch?v=5nfWcHN4zkg

⑳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적 위치와 가야할 방향은?

최근 한반도 주위 국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에 이어 미국에 방문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보통 국가화라는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동북아시아에서 이로 말미암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양국이 경제동맹을 확대하고자 하는 배경이 깔려있었습니다. 더욱이 중국 역시 역사적 장애물을 잠시 제쳐두고 일본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지요.

이러한 한반도의 주변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고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와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글로벌 경제전쟁, 생존을 넘어 승리로!

첫 번째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과거 역사문제와 다른 분야의 협력 및 외교를 분리해서 외교를 실천해야 합니다. 일본이 져야 할 역사적 책임을 저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외교에 과거사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도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에 대한 과거 역사문제에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역사적 문제를 경제적 협력으로까지 끌고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문제는 따로이고, 경제적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인식해 실리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양적교류에서 질적교류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정부는 중국과의 지속적이고 빈도가 높은 교류를 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외형적 팽창에 가려진 내용적 부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질적교류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확한 입장과 적극적 의지표명을 통한 격 없는 논의, 그리고 민간부문에서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주적 의지나 안보 사안에 대해서 우리와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교적 메시지와 이미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유연성이 있는 외교적 원칙도 필요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한중 대학생들이 서로 양국에서 공부를 하며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에 더 나아가 이들을 잘 관리해 양국의 건실한 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 역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역시도 현재 맺고있는 동맹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의 다른 외교적 노선과 충돌하지 않을 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세력을 막기위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우리나라의 실리에 따른 외교적 노선을 독자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 마지 않는 유럽의 EU(European Union) 처럼, 동북아시아의 끈끈한 공조는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고 쉽게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공조로서 우리 대학생들의 만남과 교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등 양국 간의 일대일 교류가 아닌 동북아를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여러 국가들의 대학생들이 만나 대학생의 시각으로 우리가 현재 처한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더딜지 몰라도 그들이 후에 각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민간교류는 동북아를 더욱 공고히하고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동북아 국가들간의 경제적 장벽을 허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FTA 를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부터 우리는 전세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잠재적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는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원칙에 따른 실리적인 외교정책과 새로운 패러다임인 동북아 공조를 실행한다면 우리는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동북아의 주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한일 외교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의 논의되었다.

김수빈(서울대 언론정보 2):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연구모임에 참가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드 문제부터 AIIB 참여 논란, 북한의 핵 도발, 아베 정부의 역사발언 파문까지 대한민국 주변 국가들의 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우리 국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일본과의 역사 문제인데요, 아베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위안부 관련 발언 등 역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한일 역사, 외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아베 정부의 역사 관련 발언들이 논란을 빚고 있다

배인환(서울대 언론정보 2):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명확한 사과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지점이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로 표현한 지점인데요,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아베 정부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으면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적대심 또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구요.

정수아(서울대 언론정보 2): 그러한 사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자신들이 역사문제에 대해 사과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사과를 요구할 것인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뜰에(서울대 정치외교 2): 사과를 받는 것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미일동맹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일본 정부의 이러한 외교는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안보를 위해 주변국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역사 문제 청산과 안보 모두 불가능합니다. 외교의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지은(서울대 경제 2): 경제적인 측면의 협력도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과거에 비해 일본과 경제적 격차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세계시장에서의 인식은 다르고 일본과 적대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윤정빈(서울대 언론정보 2): 저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한 반성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인 적대감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만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성을 찾고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외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싱크탱크가 커질수록 더욱 좋은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김수빈(서울대 언론정보 2):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한일 역사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아베 정부의 역사 인식 오류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국민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문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닌 급변하는 정세에 대비한 적극적인 외교와 경제 협력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외교 논쟁이 있었습니다.

박소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3) : 안녕하세요. 먼저 바쁜 와중에 선진화 연구모임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현재 한국이 처한 외교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싸드(THAAD)와 AIIB 가입 등과 관련해, 세계의 주요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으며, 중일회담 개최로 인한 중일관계 개선으로, 한국이 국제정세에서 고립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으로 인해 점점 보이지 않는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이 택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박소정 (사회복지 3) : 우선,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저는

우리나라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THAAD 논쟁이나 AIIB 를 봤을 때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우리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눈치를 보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국가인 만큼 원칙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중어중문 5) :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데에 저도 찬성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계도 우리를 예측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반응을 예상할 수 없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응백 (경제 3) :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쉽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기보다는, 이를 구체화시키는데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박지훈 (중어중문 5) : 그러나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떠오르고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중국은 우리와 우방국인 적이 없으며, 한 때는 중국 내부에서 환영받던 한국의 기업들은 현재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홀대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중국 상해보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며, 앞으로 더욱 따라잡힐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정 중앙으로만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얻을 게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핵 억지력 등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타이틀 하에 낚시질 하듯 외교적 방향을 취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응백 (경제 3) : 그러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중에 50% 이상이 중국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미국 측에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중국이 관세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우리의 GDP 등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선향 (중어중문 4) :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복관세 조치를 취해온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 역시도 무작정 한 쪽을 택하기보다는 중국이 일본에게 택해온 외교방향과 같이, 원칙을 갖되 그 때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을 따르는, 유연성 있는 정책방향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차원의 외교가 필요해보입니다.

박소정 (사회복지 3) : 동의합니다. 또 저는 이런 유연성 있는 방향을 따르되, 민간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선향 (중어중문 3) : 저 역시도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한일관계와 민간의 활동을 더욱 지지하고 이를 키워나가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하버드에서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가 더욱 퍼지는 데 일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 차원의 정면 돌파도 좋지만, 민간의 활동들을 통해 이야기를 더 알려 퍼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응백 (경제 3) :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연설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침묵 시위를 하며, 외국에 신문기사를 내는 식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더 많아진다면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 민간을 통한 일본 압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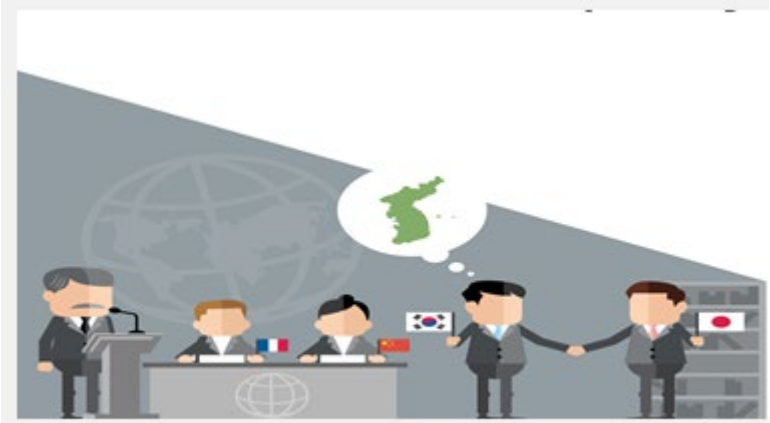
이선향 (중어중문 3) : 지금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20~30 대 청년들을 선발해, 외교적 문제나 한국의 이미지, 문화 이런 것을 알리고,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이런 것을 더 장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중어중문 5) : SNS 를 통한 활동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서, 일본은 현재 자국민들의 압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잘못된 SNS 상의 정보로 인한 반일감정과 반한감정의 강화도 이런 문제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왜곡된 역사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에게 억하감정을 가진 경우도 있던데, 민간의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으려 노력한다면, 우리 외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박소정 (사회복지 3) : 오늘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한국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민간 단체를 더욱 지원해주자는 의견과 함께 SNS 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서로에 대한 반감을 해소해나가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둘러싸고 전략적 모호성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는 의견과 미국에 조금 더 무게를 두자는 의견으로 갈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매우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한반도 주변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3 차 고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점차 고립되어가고 있는 한국의 외교정세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며 특히나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중관계의 개선은 한국의 경제적, 전략적 실리를 얻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드(THAAD) 배치, AIIB 참여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마땅한 외교적 노선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만이 아닌 활발한 민간교류를 통한 내실화된 한중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취해야 할 민간교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준수(고려대 식자경 2): 민간교류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경제적 교류'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활발한 무역관계를 추구해야 하는데 따라서 한국의 중국 시장 진출이 중요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만의 특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품목으로 농산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제적 상류계층은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 매우 불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중국인들의 한국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습니다. 중국의 상류계층만을 공략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층들을 위한 유기농산물, 혹은 다른 식품 산업들의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면 활발한 민간 경제 교류에 큰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좋은 의견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웰빙 먹거리와 같이 한국 식품의 고급화된 이미지를 중국에 어필할 수 있다면 중국 식품 시장 내에서 한국 상품의 위치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내에 한국 상품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민간 경제 교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지원(고려대 식자경 1): 그렇다면 한류문화를 통한 중국 시장 공략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중국 내에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이 이러한 드라마는 한국 관광 수요도 창출하여 부가 효과도 상당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중국 시장 내에서 한류 문화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중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를 활용한 드라마와 같은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시장 진출은 바람직한 한류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는 한국으로의 관광 수요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문화교류를 통한 민간 교류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화적 가치 공유는 국가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대중문화의 진출을 통한 경제적 실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심한용(고려대 식자경 1): 그런데 이러한 좋은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방안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외교 노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 여론을 표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민간 교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간의 인식 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준수(고려대 식자경 2): 그에 대해서는 오히려 활발한 민간교류가 우선되어야 인식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변화는 인위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낸다면 한중 관계의 인식의 변화와 외교관계의 내실화,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좋은 지적입니다. 이처럼 문화적, 경제적 민간 교류를 활발히 한다면 한중관계의 외교관계와 인식 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식 자체에 대해서도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3 차 고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윤수정(연세대 정치외교 4):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제 3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연구모임에 참가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최근 사드, AIIB, 미일동맹 2.0시대, 러시아 유라시아 회귀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신 실크로드 사업 등 한반도 주변 동북아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은 '한반도 외교정책 개선방안과 민간외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저자세보다는 우리의 외교의지를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윤수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4): 우선 저는 적어도 중국의 실리 위주의 외교 전술은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아베의 악수도 거부할 만큼 외교적으로 척을 지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최근에는 또 다시 환대를 할 정도로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을 완벽히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중국의 노련한 외교전술의 면모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실리 위주의 외교전략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김찬욱(연세대 경영 3):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런 실리 외교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외교정책에 있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국력의 절대적 크기는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전 세계로 평가해 본다면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만큼 결코 저평가 당할 국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변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서 저자세로 낮은 위치의 입장을 포지셔닝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소리와 의견을 당당하게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지수(연세대 경영 2):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략적 모호성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미국이 최고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중국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세계 파워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느 편을 드는 것보다는 이대로 중간자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엽(연세대 식품영양 2):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체제 이후로 내부 체제 강화를 위해 일부러 GDP 성장을 억제하는 측면을 보이는 등, 사실 내실 다지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국의 편을 들거나 그를 고려해봤자 우리에게 돌아올 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사이의 균형전략을 취하되 우방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해야한다.

김찬욱(연세대 경영 3):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중국이 요즘 새로운 슈퍼파워로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주한미군이 북핵 문제에 있어 가지는 전쟁억지력은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침략국 중 하나지 우방국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특히 2050년에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1위로 오른다는 예측도 있지만 그 반대 의견도 충분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속성장은 사실상 대부분이 건설업에 의한 것입니다. 개도국일수록 GDP가 인프라 건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일부러 성장률 높이려 아무도 안 사는 유령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거품 경제가 오래 갈까요? 특히 중국이 진정한 세계1위가 되려면 중국 화폐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되야 하는데 달러나 유로가 아직까지는 견고합니다. 저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 쪽에 힘을 더 싣는 것이 올바른 동시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낭경(연세대 생활디자인4):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과 지나친 역사 문제에 대한 얽매임으로 한일 외교관계에서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왜곡된 역사교육으로 인해 자신들이 가해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역사문제만 운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엽(연세대 식품영양 2): 저는 인터넷에서 단편적이거나 자극적으로 조작된 정보만 보고 반한 정서, 혹은 반대로 반일 정서가 팽배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한반도 외교 정책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찬욱(연세대 경영 3):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한중일 국가들 자체가 역사적으로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거의 전쟁의 역사로 얽혀져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민간외교 부문 활성화로 적절히 풀어나가야만 앞으로의 외교 노선을 원활히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국가에 대한 왜곡된 인터넷 정보를 바로잡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낭경(연세대 생활디자인4): 그를 위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오류들을 자정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네요. 예전에 한반도가 세계 지도에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잡는 운동을 펼쳤던 반크와 같이 한중일 국가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자발적인 한중일 협력 학생단체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수정(연세대 정치외교 4):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제 3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한반도 외교정책의 개선방안과 민간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치를 저평가하기보다는 당당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 나라로써 지향하는 외교정책 노선을 명확히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리를 위해 양면적인 모습도 불사하는 중국처럼 노련한 외교전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중사이에서 균형전략을 펼쳐야 하는 입장에서 중국이 슈퍼파워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우방국으로써 제공해주는 전쟁억지력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한미동맹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한중일 간의 왜곡된 반감 정서를 조장하는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학생단체를 조직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토론을 펼쳐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소규모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정진 (국제관계 3) :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 월 26 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제 94 차 월례 토론회를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이 고립을 피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로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 소주제를 잡았으니,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하루가 멀다하고 자국의 이익을 두고 바뀌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 있는 유연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주체성을 유지한 채 상황에 맞추어 외교 정책을 수립한다면 경제적, 안보적 실리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 간 협력 이전에 각 국의 시(市) 간 문화적,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돕고 새로운 외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황제 (국제관계 3) : 국가 간 생존 전략에서는 헤징 전략이 중요합니다. 헤징은 원래 '울타리 치기'라는 뜻으로,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위험 분산 전략을 의미합니다. AIIB 와 사드 배치 문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과 미국 간 경쟁 구도가 가장 큰 구도이므로 둘 사이에서 헤징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전통적인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헤징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경제 파트너이지만, 호주는 민주주의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는 미국·일본·인도 등과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국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사하면서 중국과는 친디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훤 (국제관계 3) : 헤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헤징 전략에서 좀 더 과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관계는 결국 눈치게임일 뿐입니다.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AIIB 에 어짜피 가입했어야만 했다면 미국 눈치 보다가 막판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초에 가장 먼저 가입을 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관계는 눈치를 보며 균형을 잡는 헤징 전략이 중요시된다

또한 그에 대한 가입으로 미국, 일본의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AIIB 가입 직후 미국과 일본에게 AIIB 에 함께 가입하자는 설득을 했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에 대해 응했을 리는 없지만, 대외적인 이러한 행동은 국가적으로 주체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고립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고립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일본과 한국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동맹 경쟁에서 일본에게 밀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주영 (국제관계 3) : 저는 김시훤 학우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과감한 선택보다는 눈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김시훤 학우의 말대로 눈치 보지 않고 AIIB 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 순간,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중국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쪽에 과감한 선택을 한 순간, 미국에 버림받음으로써 한국의 안보는 위협받을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시간을 끌며 그 눈치 보는 기간이 미국에 우호적인 한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진 (국제관계 3) : 얼마 전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상회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자위대 범위 확대 또한 조만간 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현재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며 외교적 관계가 경색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시훤 (국제관계 3) : 현재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로 대립하고 있지만, 일본을 무시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일본을 거치지 않고서는 한국에게 군수 물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보적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일본과 투 트랙 (TWO - TRACK) 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 문제는 역사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경제, 안보 문제는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지석 (국제관계 3) : 일본의 자위대의 수는 한국 군의 3 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전범국가이지만, 독일은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현재 유럽의 최강입니다. 물론 독일이 자국 군대를 늘리기까지는 그 주변 국가들이 매우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깊은 사죄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일과는 다르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결국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담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안의 진심이 어떻든 간에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대외적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사죄하는 태도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시훤 (국제관계 3) : 이지석 학우의 의견처럼 유럽의 패권은 현재 독일이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독일의 메리켈 총리입니다. 독일의 군사력은 진짜 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켈은 어디든 강하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했을 때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EU 와 유럽 경제에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 영상을 이용해서라도 대외적인 국가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만이 지닌 여성성을 외교 관계에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보았을 때, 한국은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위안부 메시지는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눈물과 아픔에 의존하여 감성에 의존하며 약하게 나가는 태도는 좋지 않은 여성성을 보여줍니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여성성을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세원 (국제관계 2) : 현재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미국은 우방국이지만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중국에게 완전히 기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노려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분리주의(투트랙)와 원칙노선은 함께 할 수 없는데 외교 정책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주체성 없이 취하는 외교 정책은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하고 이도저도 아닙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미국과의 관계를 결코 놓치면 안 되며 일본과의 투 트랙을 구사하는 외교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이정진 (국제관계 3) : 오늘 연구모임에서 김세원 학우는 주체적이고 일관되 외교 노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김시훤 학우는 현재 한국이 지닌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보다 과감한 한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반면 황주영 학우는 과감한 태도보다는 눈치를 보며 이를 또 하나의 국제적 태도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황제 학우는 전통적인 미국과의 관계와 새로운 중국 사이에서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석 학우는 일본의 사죄하는 국제적 태도는 진심 여부와 상관 없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적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④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제 3차 선진화 연구모임 진행

김다혜 (이대 중어중문): 귀한 시간을 내어 이대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몽"을 제창하고 G2 로 급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 외교의 마찰, 소련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과 남북 관계 경색 등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도의 외교적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중국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해 주십시오.



한-중 대학생들의 역사교류, 문화탐방 프로그램 활성화

강지은 (이대 보건): 한미, 한일, 한러, 한중, 남북 관계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외교 사안입니다. 마치도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어느 하나라도 끊어지면 이어가기 어렵죠. 특히 G2 로 급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중요한 사슬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서명, 한중 청소년 교류 초청사업,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한중문화교류를 위한 '출판 콘텐츠 발간'사업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한중 대학생들의 역사 교류, 문화 탐방**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산출되어 양국의 젊은 세대가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 배려를 배우도록 하는 사업을 추천합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라고 잘못된 발언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역사 교류 문화 탐방을 통해서 올바른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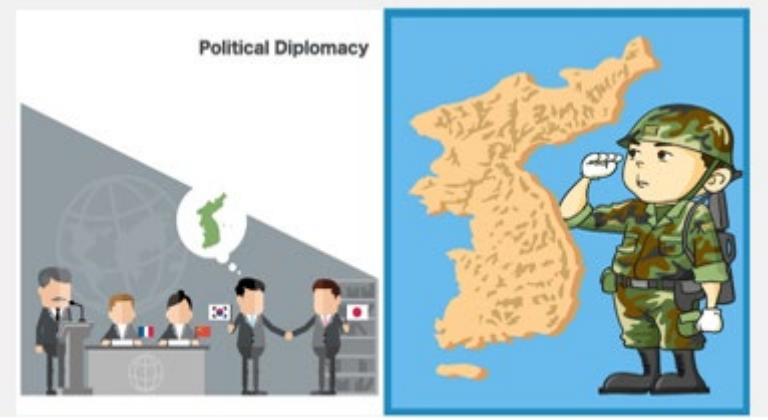
한-중 양국의 인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

이지효 (이대 경제): 현재 중국 시장을 목표로 벤처 창업을 꿈꾸는 젊은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은 한류에 푹 젖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대학생들의 벤처 창업 동아리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려우면 민간단체에서 시범을 보여 **한중 양국의 인재들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벤처 창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김소현 (이대 소비): 중국은 13 억의 인구를 가진 방대한 소비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본인들의 전공을 살려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목표를 세운다면 좋겠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같은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중국 젊은 층에서 한국 패션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를 비추어볼 때 한국의 패션 전공 대학생들이 중국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상품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생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양국 간의 경제 및 민간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안보문제, 국익에 대하여 정확한 입장을 보여주는 외교

김다혜 (이대 중어중문): 민간교류를 통해서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좋은 대안들입니다. 중국정부는 올해 3 월 "일대 일로"전략을 세우고 "신실크로드"건설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각 정부 간 정책의 적극 소통, 송유관 및 가스관, 전력 등 에너지 인프라 협력, 자유무역국 건설 등을 통한 무역자유화 추진, 국가 간 자금 유동성 확대 등을 통한 금융협력 강화, 유학생 지원 강화 및 관광 협력 등을 통한 민간교류 확대 등을 중점 추진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움직임은 대학생들에게 한중관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한중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외교 문제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경제적인 협력은 하되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 국익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지효 (이대 경제): 네 맞는 말이에요. 민간교류를 통해서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드(THAAD) 배치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참여 문제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문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은 (이대 보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경제협력, 자주국방을 실현한다는 것은 고도의 외교 정책을 요구하는 사안이지만, 너무 강력하게 나간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정책은 **유연성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강약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음악, 예술 교류 활성화

김소현 (이대 소비): 대한민국이 분단을 안고 가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입장은 시종일관 견지해야 합니다. 조금 신중하고 딱딱한 외교 문제를 유연성 있게 풀어가려면 한중 양국의 활발한 경제, 역사, 문화 교류가 밑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대학생들의 **스포츠 교류-친선경기, 음악 예술 교류- 협동 공연, 언어와 문화 교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기자단을 만들어 두 나라 대학생들의 교류 활동을 적극 소개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끈기 있고, 미래지향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통해 홍보 및 부족한 점 보완

김다혜 (이대 중어중문):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활발한 민간교류 사업 진행 방안으로 **한중 대학생들의 역사 교류, 문화 탐방 교류**, **한중 양국의 인재들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벤처 창업,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 국익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 전달, 유연성을 가진 외교정책, 친선경기(스포츠), 협동 공연(음악 예술)** 등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를 실현하는데서 **대학생 기자단**을 만들어 **적극적인 홍보와, 부족적 보완 등** 미래를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창의적인 정책과 민간단체의 다양한 협력을 기대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적원조외교나 공공외교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외교가 필요하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을 택해야 소외되지 않고 성공적인 외교를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부 측면에서 실리외교를 택할뿐만 아니라 공공외교나 민간외교를 통하여 또 다른 교류의 창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일 관계의 악화가 눈에 띄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양국 정부 간의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외교가 잘 될리는 만무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국민들에게 첨예한 갈등요소 대신 문화, 예술, 비전 등을 홍보하고 소통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공공외교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래 걸리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외교부에서 '청년공공외교단'을 뽑아 이 같은 방법을 시행코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국민들의 생각이 결국은 정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 속에 스며들어 우리나라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외교의 방향이 될 수 있겠네요.

공공외교와 비슷한 맥락에서 ODA(공적원조외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들에 원조외교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서서히 퍼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도적 차원으로 외교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고 결국 이익 돌아오게 되있는 것 아닐까요.

배수빈(이화여대 교육 1):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한 것 때문에 대만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똑같이 일본이 중국과 외교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 혐한은 심한 반면에 일본에 대한 인식은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에서 대만에 건물 등을 세워주는 등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우리나라가 원조외교를 해야 할 필요성은 또 있습니다. 한국은 6.25 때, 많은 원조 받은 나라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왜 한국에서도 도움이 필요한데 외국에만 도움을 주냐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자 하고 있으니 베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추어 한국도 원조외교를 시행하되, 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하는 일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외교에 있어서 전략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또한 외교의 방향성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접전지역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눈치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우리나라이다 보니 외교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을 잘 타되, 한쪽에만 붙지 말고 다리를 잘 걸치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중국이 급부상하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려고 하고 중국은 같은 이유로 한국을 끌어당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양국 모두 한국을 원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하여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수빈(이화여대 교육 1): 말씀처럼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외교에 있어서 요즘 핫한 이슈는 AIIB 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이 AIIB 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기까지 8 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눈치보고 결정을 피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8 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지지부진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AIIB 가입을 반대하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국이 바로 가입해버린다면 더 부정적으로 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상 시간을 끄는 것도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참신한 의견이네요. 하지만 전략상 적당히 눈치를 봐가면서 외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AIIB 가입과 관련해서는 선택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AIIB 가입은 필연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정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실속을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수빈(이화여대 교육 1): 저 역시 AIIB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중국이 AIIB 를 통하여 새로운 인프라 구축하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도 이를 통해 예전의 중동 붐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저도 AIIB 가입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흐름이 서양이나 미국 중심이었다면 AIIB 는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시아에 있는 잠재가능성 많은 나라들을 발굴하고 외교적으로 탄탄하게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결과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외교를 할 때에 있어서 실리를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맞습니다. 한 나라의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이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외교의 최선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외교의 뿌리가 되는 큰 틀을 잡아야 한다.

심수영(이화여대 교육 2): 어떤 외교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외교의 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상대국에 따라 외교의 방향이 줏대 없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가 지향하는 가치나 큰 틀을 정해놓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는 5 년마다 외교의 성향 역시 너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수영 학우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바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원칙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주체성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교는 국제정세 속에서 적당한 줄타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에 너무 휘둘리는 것도 안될 것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또 외교와 국제정세에 관한 내용에 대해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들면 국립외교원에서 원장님이나 외교관련 전문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엽니다. 간단한 신청절차만 거치면 누구든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많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국제정세가 어떠한지, 외교란 무엇인지, 외교부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등을 설명함으로써 밖으로 하는 외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외교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유명인사들도 우리나라에 대해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로 인해 중국에서 스타덤에 오른 김수현과 전지현이 장백산과 관련된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얼굴 알려진 연예인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하면 우리나라의 이미지 실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성연학우의 의견처럼 국민들과도 외교에 대해 이야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합의를 모으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맞는 말씀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국민 간의 매개체도 없고, 국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매개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암선진화아카데미가 그런 국민들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고 토론한 것을 온라인 공간을 통해 퍼트리면서 대중의 합의를 모으는데 작게나마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빈(이화여대 교육 1): 그렇군요. 하지만 모든 외교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남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THADD 배치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의 대립관계가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일입니다. 북한과 어떻게 관계를 잘 풀어나가느냐가 한국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람직한 한국의 외교 방향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를 통해 전략적 우위를 잘 활용하여야 하며,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외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또한 공공외교나 공적원조외교 등으로 새로운 외교의 국면을 열어가야 할 것이며 외교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 국가의 근본 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관련 교육 역시 필요하며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외교의 핵심이라고 언급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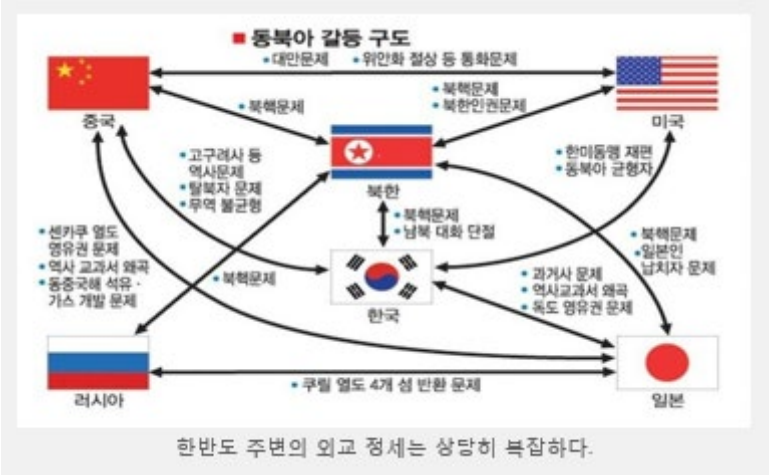
⑤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승찬 : 늦은시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준 3 분께 감사의 말을 드리며 '5 월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의 주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외교무대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 입니다.
토론순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설명, 각자의 방안 발표, 상호 토론, 결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모임 주제는 한반도 외교 전략이다.

김승찬 : 먼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설명부터 있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대륙세력와 해양세력이 경쟁하는 주 무대이며 이 무대 위에는 두 세력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한 세력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위시한 대륙세력, 다른 세력은 한국, 일본, 미국을 위시한 해양세력입니다.

두 세력에 속한 국가들은 서로 서로 얽히고 얽힌 관계인데요 협력보단 경쟁을 하는 관계입니다. 현재 대륙세력의 팽창에 해양세력이 견제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서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입니다. 최근 잠수함 탄도탄을 개발하는 등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외교 정세는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므로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싸우는 무대이며 그 무대에 사는 대한민국이 두 세력에 양다리를 걸친 상황이지만 북한이 계속 비수를 들이대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김승찬 :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자가 생각해온 외교전략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외교전략 방안은 민간외교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민간 간의 관계도 함께 중요합니다. 민간 관계가 활발히 돼야 그 나라 정부에 우회적으로 압력을 넣거나 관계가 나빠져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우회루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외교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팬을 전 세계에 얼마나 만드느냐? 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만족시키는 유 무형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동시에 인적 교류도 활발히해야 합니다. 국제정치도 인맥싸움입니다. 협상대상에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유리해 지는 건 어느 영역이든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들여다 보면 60 억 세계인이 있습니다. 그 세계인이 자기가 속한 정부를 만들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민간외교를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얻어야 세계인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한반도를 감싸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박진호 : 저는 한일관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과거사로 인해 관계가 악화될수록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지고 일본은 미국과 그만큼 더 유착이 되고 미국은 대한민국이 동맹이 아니라 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력균형이 한 쪽으로 쏠리거나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생기고 결국 악영향을 받습니다. 비록 밉긴 하지만 감정은 감정이고 이성은 이성입니다. 그게 외교전략이지요 한일관계를 강화해야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을 도모하고 그와 동시에 따로 중국과의 관계도 우호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중국도 한반도 안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세로 중국에게 요청하지 말고 당당하게 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복잡한 외교상황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봅니다.


아직은 일본은 쓸모가 있다.

김승찬 :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 및 우호적인 한중 관계를 주장하셨네요 다음은 송기성 학우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기성 : 국제관계와 관련된 유명한 표현중 하나가 국제무대는 연극무대라는 것입니다. 주인공 및 감독이 초강대국 조연이 선진국 및 지역강국, 악역이 주인공에 반대되는 세력, 엑스트라는 약소국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외교무대의 주인공은 미국입니다. 비록 흔들리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미국이 주인공이며 이 주인공의 눈밖에 나면 엑스트라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여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일본 간의 관계를 볼 때 저도 박진호 학우의 생각처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이 아직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이 힘을 키운 후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남북 간에 통일이 되어 강한 국력을 손에 넣어야만 일본의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승찬 :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통일을 해야 일본의 사과를 받는다는 의견이 인상적이네요 다음은 이동건 학우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건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됩니다. 분쟁지역이라는 특수적 상황으로 인해 열강들과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인접한 아시아 각국에서 남·북 간의 갈등에 촉각을 세운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과 중·일 간의 영토분쟁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의 다양한 범주의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측면으로 대한민국 주도의 동아시아 다자의결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APEC 을 비롯하여 ASEAN 3+와 같은 의결기구가 존재하지만 이들 기구는 협력차원으로서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동아시아의 극단화된 정세 변화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또한 APEC 의 경우 아시아 외의 환태평양 국가들도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담론이 충실히 제기되지 못하고, ASEAN 3+는 동남아시아 중심의 기구로서 동북아 3 국의 국제적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영역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다자의결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구의 등장은 아시아의 국제 정세에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김승찬 : 새로운 국제기구설립을 통해 국제정세 안정을 도모한다는 야심찬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주장에 대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진호, 송기성 학우의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칼을 들이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상대하고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과 손을 잡는건 꺼림직 합니다.

송기성 : 일본이 과거사 사죄를 안 하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허나 국제외교를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과거사 청산을 잘한 독일도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엔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외교무대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무대입니다. 감정 따로 이성 따로 행동해야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되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관계는 저울에 재는 것 처럼 냉정하게 봐야 한다.

박진호 : 저는 송기성 학우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통일을 해야 일본의 사과를 받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저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송기성 : 어렵고 현실적이 않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통일을 하지 못하더라고 우리 품에 안겨야 일본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강력한 발언권을 손에 넣기 때문에 통일을 향한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건 : 제가 보았을 때 국제 외교의 방식은 일대일이 아닌 다자간 외교로 중심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한일 한미 한중 이렇게 따로 놓고 볼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어떤 식으로든 엮여있기 때문에 한쪽이 움직이면 나머지가 영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처럼 외교를 진행하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를 롤 모델로 한 공동체를 동아시아(동남아시아 포함)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의 발언권을 높이고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개입 못한 가장 큰 이유가 EU 의 존재 때문입니다. EU 가 없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EU 가 있으니 유럽지역에선 러시아가 위협을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국제기구를 만들거나 기존 아세안을 확장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김승찬 : 제가 제안한 민간외교 강화전략이 곁들여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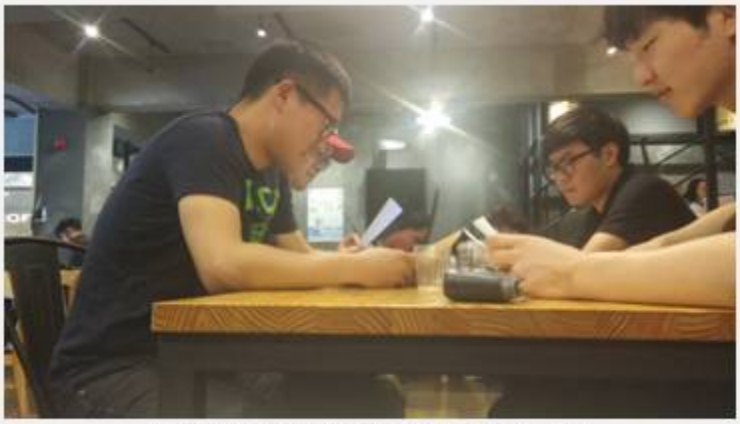
이동건 : 네 맞습니다. 병행을 해야 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이 기구에 북한도 참여를 시키면 통일문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2 시간 동안 참여한 학우들의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직까진 한미일 삼각동맹이 중요하며, 대한민국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동아시아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민간외교 전략도 활용하면 훌륭한 시너지 효과도 나온다는 것이 오늘 모임의 결론입니다. 이것으로 5 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⑥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KELF 학생들과 제 3회 연구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김한준(공주교대 초등교육 4) : 지금부터 KELF(Korean Economic Leaders Federation)한국경제리더연합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설립으로 미국과 맞먹는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려는 중국과 주한, 주일미군의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도입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TPP(Tr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가입 등으로 중국의 급부상에 견제하려는 미국의 태도는 동북아 정세를 급변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우경화와 이에 따른 한일관계의 경색, 소련 시절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 도발 행위에 따른 남북 관계의 경색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동북아 외교 정세 변화에 적응치 못하고,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안보적 급변 속에서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및 균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외교, 안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남북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시장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있는 개성공단의 생산 제품들을 북한의 국영상점과 장마당에 판매하여 북한의 내수시장에 진출하여 자연스럽게 시장개방의 문을 열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유경훈(인하대 경영 4) : 개성공단의 물품을 국영상점과 장마당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북한경제의 폐쇄성과 남한 제품에 대한 북한 정권의 거부감으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고, 대한민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장마당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국영상점에서 판매를 하거나 평양, 함흥과 같은 대도시에 개성공단의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든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황영준(서울시립대 경영 3) :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상품들이나 상표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물품은 북한의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처음 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품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품의 조작 방식을 더욱 간소화하거나, 순 한글로 된 제품명을 사용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이 새로운 상품을 쉽게 접하고, 북한 정권에도 그들의 체제에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물건을 접할 수 있게 한다면, 북한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의 폐쇄성이나 재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협소한 시장을 봤을 때 개성공단의 제품을 장마당이나 국영상점에 팔게 하는 것은 효과가 작습니다. 따라서 대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해 관계개선을 꾀해야 합니다

김한준(공주교대 초등교육 4) :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경제의 폐쇄성이나 재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협소한 시장 등으로 개성공단의 제품을 북한의 내수시장에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0 년 이후부터 개성공단의 제품을 국영상점에도 판매를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개성공단 제품 판매점을 만들거나 북한 주민들에게 맞는 제품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취한다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방법 외에도 문화나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을 통해 대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황영준(서울시립대 경영 3) : 일제시대 서울과 평양 간의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였던 경평축구 등 남북한 간의 스포츠 행사나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간의 느슨한 연방제체제 하에서 국가적 단결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인 축구 및 럭비 대회 등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형균(고려대 경영 2) :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 중국이나 개도국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체제적 전환이 이뤄지긴 어렵지만, 젊은 층이 자본주의에 어느 정도 개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일성 종합대학과 서울대와 같은 남북의 명문대가 서로 학생들을 교환하거나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립함으로써 남북 간 인적교류와 교육적 교류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만 그치는 것보다 인적, 교육적 교류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유경훈(인하대 경영 4) : 저는 문화 사절단 등을 파견하자고 김형균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남북한의 대학들이 서로 인적, 교육적 교류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한의 젊은 사업가들을 파견해 남북이 스타트업 기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업들이 정부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이 크지만 남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영노하우를 전수받는다면 북한시장의 개방과 남북관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인적, 교육적 교류의 상징입니다.

김한준(공주교대 초등교육 4) : 네, 좋은 의견에 감사합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경우 대한민국의 사단법인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의 교육성이 함께 설립하였고, 2010 년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이나 김일성종합대학 등 북한의 대학과 서울대, 카이스트 등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서로 공동의 연구프로젝트를 시행한다거나, 교환학생 파견, 학내 스타트업 기업 창업 등을 추진한다면 남북관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많이 냉각이 되긴 했지만, 북한의 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한데, 대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를 단순히 견제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우 여려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경훈(인하대학교 경영 4) :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는 북한이 문을 열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북한이 먼저 문을 열길 기다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내실화를 다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자원이나 인프라에 있어서 중국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자원 및 인프라 사업에 단순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진다고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다지고 이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꾀할 수 있습니다.

김형균(고려대 경영 2) :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 주도의 AIIB 에 가입을 했는데 미국과 일본 주도의 ADB(Asian Development Bank)나 세계은행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AIIB 에 5%라는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AIIB 의 자금을 지원하고,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황영준(서울시립대 경영 3) : 중국이 최근 북한 내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고, 나선직할시 개발과 무산철광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폐쇄성과 대북 영향력을 독점하려 하는 중국의 태도를 고려할 때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한준(공주교대 초등교육 4) : 지금까지 저희 네 학우가 동북아의 외교, 안보 정세의 급변 속에서 대북관계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북한의 경제개방 유도를 통해 대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개성공단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국영상점을 전국에 설립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경제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으로 경제적 교류만으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경평축구의 부활과 같은 스포츠, 문화 교류와 남북한 대학 간에 공동연구를 진행하거나 교환학생, 교수들을 파견하는 등 인적, 교육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스타트업 경영인들을 북한에 파견해 북한 정부 산하의 기업소에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남북한이 공동으로 설립한 평양과학기술대학에 학내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 인적, 교육적, 경제적 교류를 융복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과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폐쇄성과 정치적, 재정적 불건전성으로 중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북 간의 관개개선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길 기다리거나,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경제, 교육,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개방을 이루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다소 미흡했으나, 참여해 주신 모든 학우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 어느 때보다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학우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3 차 KELF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⑦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지금부터 '원광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거부터 지리상 한반도는 많은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현대에 들어서도 Thaad 배치, AIIB 가입, 북한문제 등 많은 외교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교적 논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 모임은 우리나라 외교의 향후 비전 및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앞으로의 외교 비전을 실리외교와 자주외교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허브 역할에 해당하며 주변에 강대국이 많습니다.



격동기에 실리외교 노선을 취한 광해군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외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경(원광대 국제통상 4) : 박재형 학우가 말했듯이 요즘 우리나라는 주변국들과의 외교문제가 많죠 앞에서 말했듯이 Thaad 배치, AIIB 가입도 그렇지만 한일 간 역사문제, 북한문제 등 우리나라가 세계의 화약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박재형 학우 말처럼 실리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중립외교를 비전으로 두었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 유럽의 스위스가 중립노선으로 조그마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온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립외교를 추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외교가 되야 나중에 혼란과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

최민정(원광대 역사교육 3) :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 외교에 있어 눈치외교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로 눈치를 보고 있다 생각하는데 상대국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며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는 거보다 차라리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외교를 추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상경(원광대 국제통상 4) : 최민정 학우 말에 동감합니다. 눈치를 보며 외교를 해서 그때의 위기나

상황을 넘긴다 해도 나중에 다시 더 크게 돌아오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나라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고 타국으로부터 생길 불이익을 최대한 감소시킬 방안을 찾아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외교비전이 중립외교 노선을 취해야 한다. 입장표명을 확실히 해야 하는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서 Thaad 배치와 AIIB 가입에 관해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적 큰 이슈가 되었던 Thaad 와 AIIB

저부터 의견을 내자면 Thaad 배치는 반대고 AIIB 가입에는 찬성입니다. 이유는 Thaad 는 명목상 북한의 미사일을 견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견제 목적이 더 크다고 합니다. Thaad 를 배치하는데 미국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우리 돈으로 사와야 하는데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될거라 생각합니다.

배상경(원광대 국제통상 4) : 저도 Thaad 배치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하지만 박재형 학우처럼 아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고 안보에 있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박재형 학우처럼 경제적인 손해가 더욱 클 것이라 생각하며 Thaad 를 쓸 일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AIIB 가입은 찬성하는데 무역이나 경제에 있어서 중국에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AIIB 가입은 중국의 시장에 더욱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점을 정부에서 보고 AIIB 가입을 하기도 했구요.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저도 이번에 정부가 AIIB 가입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전에 제 블로그에 Thaad 배치와 AIIB 가입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안보가 더 중요하며 미국과는 혈맹이니 무조건 미국편에 서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 현시대는 경제가 안보의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세계화가 덜되고 자국의 경제만으로도 돌아가는 구조였으면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현재는 과학이 많이 발전했으며 국가 간 경제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안보를 더 중시하여 국방비를 늘린다 해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을 들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군사력을 따졌을 때 양으로는 2 배 이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질적인 면에서 많이 뒤처지며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경제로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더 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시대는 경제가 안보보다 더 중요하다 봅니다.

배상경(원광대 국제통상 4) :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군사적으로는 미국에게 의존이 많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게 의존도가 큰 것이 현 실정입니다. 양국과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견제중인 상황이라 아까 말했던 눈치외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방안이 찾기 힘들다는게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아까 앞에서 말한 외교비전을 실행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방안이 있을까요?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경(원광대 국제통상 4) : 조금 엉뚱할 수도 있는 말인데 앞에서 말한 중립외교 주체적인 외교를 하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외교에 대해서도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테고 젊은이들의 좋은 생각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은 안목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

최민정(원광대 역사교육 3) : 저는 유능한 외교관을 키우는 것이 앞에 말한 외교비전 실행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교육으로 정해진 문제를 푸는 방법만 알려주곤 했는데 프랑스처럼 사소한 것에도 토론하는 연습을 키워주며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저도 같은 생각인데 좀더 보충하면 어렸을 때부터 세계의 문화라던지 역사 등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의 문화 역사 교육을 잘 아는 것부터가 외교의 시작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제기간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은 우리나라의 향후 외교 비전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보았고 외교비전에 관해선 중립외교, 주체적인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외교비전 실행 방안에 대해선 젊은이들이 정치관심을 가지자, 어렸을 때부터 외교관을 키워야 한다는 등의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훌륭한 외교는 고려시대 서희의 외교담판에서 보듯 국가에 이득이 되고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과거 서희처럼 훌륭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 내주셔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⑧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홍익대학교 학생들의 선진화연구모임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의 힘싸움 속에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고민을 대학생의 시각에서도 깊이 있게 나눠보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정세 속 한국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 중인 사드(THAAD)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에 대하여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 나아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외교적인 방향에 대한 생각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군사적인 동맹관계인 '한미동맹'은 60 년 이상을 이어온 끈끈한 안보적 협력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드(THAAD)배치와 같은 안보적인 사항은 얼마나 국방을 위하여 도움이 될 지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THAAD)를 배치할 경우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껄끄러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면, 중국에게 그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한 후에 이를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한 광해군의 중립외교

박홍근(홍익대 도시공학): 제 생각은 박현진학생과 조금 다릅니다. 저는 요즘같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태도는 조선시대 광해군이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가졌던 '중립외교'와 같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어느 하나의 나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전세계를 이끄는 막강한 강대국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정아(숙명여대 영어영문학): 저는 박현진 학생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대로 추진하되, 중국과 같은 주변 국가들에게 좀 더 부드러운 태도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에 많이 찾아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

김정환(홍익대 토목공학):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숫자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우리의 경제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꺼리는 결정을 한다면, 그 이유가 어떻든 분명히 우리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 학생의 말처럼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최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만약에 어떠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인상을 준다면, 어느 국가에게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성공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김정환 학생의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인 협력 문제이지, 안보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사드(THAAD) 배치와 같은 안보적 결정은 미국과 상의하고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최근 이슈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중국과 관계되는 경제, 금융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생각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박홍근(홍익대 도시공학): 저도 박현진 학생의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 결정을 내리는 데에만 약 8 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초기에 중국과 빠르게 협력관계를 맺었다면 좀 더 관계가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정아(숙명여대 영어영문학): 저는 일본의 태도가 맘에 들지는 않지만, 조금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외교적으로 본인들의 확실한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더더욱 끈끈해졌고, 최근 들어 중국과의 관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애매한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인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홍익대 토목공학): 이정아 학생의 의견도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은 아직 군대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확실한 본인의 편을 만들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북쪽으로는 물론 한 민족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주적인 북한, 동쪽으로는 100 여년 전 우리를 식민지배했던 일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직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확실한 하나의 아군보다는 주변 모든 나라와 최대한 잘 지내는 것을 외교 전략으로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홍근 학생은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같은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고, 김정환 학생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중립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여, 이정아 학생은 우리의 국가적인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밀고나가되, 이를 주변 국가들에게 부드럽게 설명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으로 중국과는 경제적인 협력관계, 미국과는 안보적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외교적인 태도를 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⑨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백송희 (단국대 무역학 2): 지금부터 단국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연구모임에 참가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과 남북관계 경색 등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일본과 관련된 일입니다. 위안부 사과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독도문제까지 일본의 우경화와 이에 따른 한일 외교 마찰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난세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좋을지에 대해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과의 마찰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끊임없는 사과 요구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요구는 일본은 물론 미국 등의 다른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준(단국대 기계공학 1) :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죠. 따라서 대국민의 통일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국민의 의사를 모아 이에 충족하는 사과를 받는다면 이 논쟁은 종결되야겠죠.

유소라(단국대 법학 2) : 사실 엄청 참신한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해답은 알고 있지만 실천이 어려울 뿐이죠. 사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유독 일본이라는 나라에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근본을 파헤쳐보면 역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역사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은 하되 무조건적인 비난은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아예 일본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준(단국대 기계공학 1) : 저는 이에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다른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말이 안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외교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의와 이익은 다르지만, 대의없는 이익은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역사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박해지(단국대 사학 3) : 동아시아의 경우에 특히 역사가 이데올로기에 많이 이용됩니다. 정계를 보자면 '민족주의'를 국민을 통합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이것은 중국, 일본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는 모두 겉포장에 불과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상호 연관되어 발전된 문화이지만 근현대에 들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그 나라의 국력이 된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그 포장을 역사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분리하지 않은 채로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각 나라 내부적으로 사회 통합에 쓰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교육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자신의 역사가 가장 최우선이고 다른 주변국은 열등하다는 교육은 우리 나라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역사가 수단이 되어버리면서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니 소통이 단절되고

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생이 인문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이 사학이지만 고등학교때 배웠던 것과는 무척 다른 사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문학은 시야를 넓혀줍니다.



교육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또한 국가는 지금의 교육체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만 좋은 역사를 내보이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미 수단이 되어버린 역사는 우리나라를 정체시키는 올가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 정서에는 민족주의가 쓰일 곳이 많지 않습니다.

유소라(단국대 법학 2) : 저는 오히려 역사를 배제한 친교 위주의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지면 한일 관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고 대신 사망한 한국인을 기리는 차원에서 일본이 한국인들을 초대해 일본 견학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 지인이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일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으며 당사자 뿐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우호적인 기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일 관계의 개선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차원에서 우호적인 제스쳐로 대학생들을 선발해 일본의 좋은 점을 배우고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을 만들어 상호 교류한다면 침체되어 있는 한.일의 경제에 호전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측면을 넘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면 경직된 한 일 외교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백송희(단국대 무역 2):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경직된 한일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에 대해 논의해보았는데요, 교육제도를 바꾸어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과 확실한 태도를 통해 명확한 사과를 받고 그 이후에 한.일외교를 풀어나가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외의 친목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우호적인 입장을 이끌어 내어 한.일 외교를 풀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송민상 (중앙 정치 3)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중앙대 선진화 연구모임'을 위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차관보가 연달아 방문하며 싸드(THAAD)배치와 AIIB 가입 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시각차를 드러내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고, 냉랭하던 한중일 관계는 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고립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역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이며 한국 외교가 총체적인 전략 부재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앙대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대외정세의 상황은 어떠한지 한미, 한중, 한일, 남북의 양자 관계를 중심으로 토의해 본 후, 한국이 취해야 하는 전략적 외교 노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미관계에 있어 한국의 해방 이후 발전 과정에 미국이 안보적, 경제적으로 그 동기가 무엇이었건 많은 지원을 해주었었고, 한국이 그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한중일 삼각동맹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관리하려한 이해관계도 작동한 것으로서, 한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주체적인 목소리도 점차 확대해 나가 상호 동등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한미·한중·한일·남북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신혜원 (중앙 중문 3) : 한미 관계에 있어 미국이 한국의 개발연대 시기 안보적·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 이에 비해 반미감정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영국·일본과 같이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창 (중앙 중문 2) : 동의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에 THAAD 를 배치하려는 의도를 북한 때문인지 중국 때문인지 확실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원선민 (중앙 중문 3) :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발전·군비감소· 안보증가 등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얽혀있을 때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어느 한쪽이 우세한 것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특히 미군 범죄자 인도 문제와 같은 경우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거의 전무한 상황만큼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중앙 중문 3) : 한중 관계에 관련해서는 한국의 주장과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수출 거래량이 중국 27%, 미국 11%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품목 외에 관광 상품 등에 대한 중국 시장과의 거래량이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선인 (중앙 중문 2) : 한국과 중국의 수출품목들 중 겹치는 품목이 많은 측면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는 중국이 추후 유일한 패권 강대국으로 성장했을 시 우리는 중국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은 경제적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을 시사합니다.

원선민 (중앙 중문 3) : 한편 최근 북한의 핵개발·미사일 발사 실험 등의 행보로 인해 북중관계보다 한중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이는 중국이 과거 정치적 체제의 동맹보다 경제적 이득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인 (중앙 중문 3) :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외교적으로 미국과 전통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측면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아베는 방미를 통해 친미 노선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며 미국의 비호 아래 집단적 자위권까지 획득하였습니다. 한일 갈등 속에서 최종적으로 미국이 어느 국가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송민상 (중앙 정치 3) : 중국의 경우 역시 내부 반일감정이 한국에 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일 양자간 정상회담은 진행하였습니다. 진실성에는 의문이 있지만 일본이 국제적으로 한국과 적극적인 대화의 제스처를 펼치는 전략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해 나간다면 오히려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을 당국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일의 리더들이 정치적으로 반일·반한 정서를 이용하여 내부 국민의 결속력을 증가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 역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외교적 대화를 단절시키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원 (중앙 국물 2) : 한국과 일본사이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역사문제일 것입니다. 역사문제로 인해 모든 외교가 차단되어 버려서 다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안건들에 대해 논의의 가능성조차 완전히 차단된 것 같습니다. 역사문제와 다른 안건을 TWO-TRACK 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중앙 중문 3) : 이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다른 안건을 위해 역사문제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역사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협상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강요하는 태도는 국제적인 외교 시각에서 한계를 지닐 수 있는 점 역시 국민들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원선민 (중앙 중문 3) :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시장 거래량이 커진 현재 일본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역사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시대를 오판한 일본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역시 자신들의 국제적인 위상과 역할에 대한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송민상 (중앙 정치 3) :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제도화의 수준이 높은 국제제도·기구에 북한을 가입시켜 자국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감시감독제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보다는 차라리 전기·수도 등의 자원을 북한에 공급하는 망을 구축하여 북한의 실질적인 대남 의존도를 높이고 동시에 통일을 대비하는 전략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미·한중·한일·남북을 둘러싼 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대외정세에 대해 토의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외교 노선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인 외교 노선은 무엇일까?

정성원 (중앙대 물류 2) :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용해 서로를 견제 중인데 이를 우리나라는 역으로 이용하여 편가르기가 아닌 과거 광해군의 중립외교처럼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선민 (중앙대 중문 3) : 좋은 의견이지만 현재 한중미 관계는 과거 조선·명·청의 관계와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력은 중국에 안보는 미국 사이에 의존하며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사안별로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떨까요?

신혜원 (중앙대 중문 3) : 저 역시 현재로썬 중립외교 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패권국은 미국이지만 앞으로 중국 주도의 세계정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인 (중앙대 중문 2) : 저는 중립외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대립은 어느 한 쪽이 흥하면 어느 한 쪽이 망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에 이 둘 사이를 오가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상 (중앙대 정치 3) : 저는 현재 우리나라는 사안 마다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장기적으로는 실리가 없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대아시아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등한시 하고 언제든 중국 편을 들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큰 문제라고 볼 것입니다.

2 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한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협이 되었던 소련과 일본 등을 전쟁 없이 국제 질서를 이용하여 흔들어 놓았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부상하는 새로운 패권국으로서의 중국을 제재할 장치는 충분히 마련해 놓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중국 측을 섣불리 선택하여 후에 불리해질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창 (중앙대 중문 2) : 동의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골랐을 때 잃을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 아시아 정세와 한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에 편승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 규모 감소 중 장기적인 국익이 큰 것을 선택한 후 상대적으로 포기한 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상 (중앙 중문 3) : 한국과 비슷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이해관계가 동시에 얽혀있으면서 남·북의 분단이라는 특수성까지 갖춘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대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한국 외교정책의 전략적 모호성이 커지는 현재 취할 수 있는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호 아래 사안별로 이익을 챙겨 나가야 한다는 중립외교 노선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의 패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현실주의 노선으로 갈려 서로 다른 시각에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열성적으로 토의에 임해 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며 오늘 '중앙대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⑪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송소담(서경대 공공 4): 지금부터 서경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귀한 시간 내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한중관계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한중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한중관계는 ‘내실화’에 주목하면서 전략적으로 다자관계 내에서 사안별로 상호연계의 강약을 지혜롭게 선택해나가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긍정적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중관계는 ‘민간차원의 건실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건전하게 발전하기 어려운데요.

이에 이번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한국과 중국이 각 국의 인기배우나 아이돌을 주연으로 하는 한류드라마나 다큐를 공동 제작하는 등의 쌍방향적이고 국민 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의 강화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방문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재방문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한중 관광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과 인문교류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각 국의 지역문화와 스포츠 행사는 물론 테마도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인문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데에 긍정적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여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박준희(서경대 경영 3): 지속적인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저는 특히 '재방문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최근 중국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관광지가 '노량진 수산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데요. 이러한 장소는 급하게 관광지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통역시스템도 안되어 있고, 관광지로 특화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중국 관광객들이 이러한 곳에 방문을 한다면, 한국 관광에 대한 불편함은 물론, 자칫하다 바가지만 쓰여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 관광객들의 재방문 횟수를 늘리기 위하여 현재의 트렌드에 맞추어 각광받는 관광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여 중국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인의 낮은 시민의식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재방문하는 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인들의 매너라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어로 더듬더듬 길을 물어볼 경우 일본인들이 직접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한국인들이 중국 관광객을 업신여기고 바가지를 씌우는 등의 비매너적인 행동과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데요.

이에 우리는 타국의 관광객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관광 명소 방문에 목적을 둔 재방문은 중국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 이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저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이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분위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송소담(서경대 공공 4): 제가 며칠 전 이와 관련한 뉴스기사를 보았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을 재방문하지 않는 이유 1 위가 숙박업체들이 불친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숙박업체들이 인터넷 상의 이미지나, 전화로 이야기한 내용과는 다른 서비스를 보여주어 신뢰를 져버린다는 것인데요. 이는 신뢰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인들에게 매우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신(서경대 공공 2): 저는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국제 봉사단'을 조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최근 네팔지진 사건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안타까워하였고, 구호물품이나 인력을 보내주는 등의 봉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저는 이에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각 국에서 일정 인원을 뽑아 국제 봉사단을 조직하는 것이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 봉사단을 조직함으로써 그 속에서 만난 여러 국가들이 서로 교류하여 자국을 홍보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국제 봉사단의 봉사자들은 엄격한 인성면접을 통해 선발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공동연구'를 통한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

권소연(서경대 공공 4): 저는 학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공동학술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역사를 공동연구 함으로써 아픔을 공유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여 보다 우호적이며 지속적인 한중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소담(서경대 공공 4):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역사공동연구'라는 의견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서경대 경영 3): 저도 '역사'에 초점을 맞춘 의견인데요. 삼국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읽고 그 내용을 알고 있듯이, 우리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역사에 관한 내용을 접하고 알 수 있게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가수가 합쳐진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권소연(서경대 공공 4): 저는 또 다른 의견으로 K-POP 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재, 중국에서 한국의 아이돌로 데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활용하여 중국과 한국의 가수들이 합쳐진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중국인을 포함한 아이돌 그룹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여 큰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러 그룹에 중국인을 포함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과 중국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 우호적이고 지속적인 한중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소담(서경대 공공 4): 지금까지 우호적이고 지속적인 한중관계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토론을 해 보았는데요. 그 방안으로 한국인의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거나,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중국 관광객의 재방문을 늘리는 방안, 국제 봉사단을 조직하는 방안, 역사를 공동 연구하는 방안, 우리역사에 관한 내용을 접하고 알 수 있게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방안,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가수들이 합쳐진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한 모든 것들은 한중관계의 우호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⑫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정우재(한양대 3) : 지금부터 서울지역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외교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한 후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한반도 외교에 있어서 갈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명확한 국가적 목표와 가치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취하지 못하고 미중 간 갈등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한 국가의 의지표현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가치와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여 외교적 전략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정책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올 때마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주체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주강인(한국외대 4) : 저 또한 외교시에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지체 없이 주체적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외교는 실제로 문제가 많습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라간의 동맹, 다르게 표현해 보면 '편먹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확실한 동맹국을 두고도 모호한 태도만을 취하고 있으니, 중국과 미국의 눈치만 보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주변의 대외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주위에 평범한 보통의 나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계 1 위 국가인 미국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2 위, 3 위 등 최강대국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의 주장만을 내세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유연(서강대 4) : 저는 주변의 강대국들도 분명 문제지만 특히 북한이 주체적 국가를 지향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한국과 같이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먼저 공격을 감행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며 외교 무대에 있어서도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북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여 위협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도 맞대응은커녕 겨우 싸드라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는 것에도 논란이 있는 지경입니다.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며, 이런 것조차 논란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는 확전 자제를 통해 평화를 도모하고 북한과는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굴종적 평화일 뿐, 우리나라 안보나 외교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국가별로 특화된 외교 전문가가 필요하다.

구재희(경희대 4) :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다르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정치는 한 나라 안에서 문화와 국민의 가치관 등 그 배경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경우 각 나라들은 모두 문화와 가치관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국제 정치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 년 12 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미국 학자가 "중국은 왜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미국 편이 되도록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미국

학자는 자국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세계관과 미국의 세계관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형식적으로나마) 약소국을 자신과 대등하게 대해줌으로써 약소국과의 관계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국제정치에서 위계질서의 제도화, 형식화가 중국 국제정치사 2000 년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으며 대국과 소국 사이에 지켜져야 할 모종의 규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들의 외교 정책은 지정학적으로, 전통적으로 다른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별로 전문화된 학술적이고 현지체험을 통해 특화된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나라별로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러한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여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재(한양대 3) :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정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 저 역시 공감합니다. 위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국제정치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약육강식의 냉혹한 세계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국제정치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인 면이 앞서는 경향 때문에 이성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복지가 이루어지거나 시위나 집회를 통해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지만 국제정치에서는 이러한 자비를 기대한다면 바로 다른 나라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강인(한국외대 4) : 맞습니다. 바로 일본과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비록 일본이 역사 왜곡을 일으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우리가 계속 과거에만 집착하는 나머지 미래에 대한 고민은커녕 현실조차 보지 못하고 국제 외교에서 입지를 잃어가는 느낌입니다.

학교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교가 너무 아마추어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구제불능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구제불능이 사과를 할리는 만무하고,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진심이겠냐며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에 집착하기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 과거의 문제와 별개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유연(서강대 4): 12 일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의 회의에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들은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나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본 재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는데 우리 정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일 유착과 중일 정상회담 속에서 한국만 왕따가 되는 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 역시 그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어떠한 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호적으로 정책을 전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재희(경희대 4) :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에 한정적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국이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연대해야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갈등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명백한 전략 착오입니다.

정우재(한양대 3) : 공감합니다. 중국이 다시 패권을 노리며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북한을 영향력 하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중국 관료들이 한국 외교관들에게 '미국만 없으면 너희들은 끝이다' 내지는 '속국관계로 가자'며 공공연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미국과의 동맹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정치인과 관료의 역량이 중요하다.

김재훈(동국대 4): 저는 외교의 문제가 내치(內治)의 문제에서 있다고 봅니다. 외교가 한 가지 목표를 구심점으로 삼아 전략적이고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다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안이함에 빠져 전문성 없이 상황을 낙관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정당 또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사드 도입의 논란은 또한 청와대와 여당의 엇박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시작된 여당과 보수언론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에 대한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공격은 집권 3 년차 당청 간 주도권 다툼 와중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독도 입도 지원시설 건립 문제는 정부 내 엇박자 사례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 건의 경우에는 유네스코 등재가 임박한 상황에서 교육부 출신인 주 유네스코 대사가 임기 중에 기관장 공모 신청을 이유로 귀국하면서 외교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치를 도맡아 당청 간 조율을 하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아야 할 국무총리는 벌써 4 주 가까이 후보도 뽑지 못하고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외교에서 실패하고 나라가 힘을 잃게 되면 국내 정치의 순항 가능성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 행위가 나라 전체를 흔들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우재(한양대 3) : 좋은 의견입니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어떠한 군사적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나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대내갈등에 치우쳐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노리고 있는지 대비는커녕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서 안보에 안일해진 것인지,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서 힘쓸 겨를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보관과 외교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정우재(한양대 3) : 대한민국이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지정학적인 이유, 그리고 북한이라는 비정상국가의 존재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결책으로 국제정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 국가에 특화된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감정이 지나치게 앞서는 것을 자제하고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 관료와 정치인들을 비롯한 내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제시됐습니다.

이 의견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외교의 방향에 있어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화 과제 8: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 68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강소라(서울여자대학교 콘텐츠디자인학과)

싸이의 '오빤 강남스타일' 덕분에 중소기업이 웃는다?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이 시점. 울고 있던 중소기업이 웃기 시작했다는데요. 바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K-Pop 등 한류 열기가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노래 한 곡으로 해외에서 '코리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수출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 년 이명박 대통령은 '소프트 파워'와 문화산업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 브랜드 위원회'를 설립하며 정책 측면에서도 문화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국내 문화산업이 성장하며 수출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마영삼 외교통상부 평가담당 대사는 "외국인들이 한국 노래에 관심을 갖게 되면 점차 우리 문화를 좋아하게 된다"며 "그렇게 시작된 관심이 결국 우리 물건을 사게 하고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선전하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은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최고 수준의 화장품 대우를 받는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가요 등 한류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브랜드를 높여 경제성장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문화산업은 중요합니다.

문화산업이 한국에 끼친 긍정적 영향을 수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류가 제조업 분야의 매출증대에 미치는 기여도도 향후 더 커질 전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수출중소기업 132 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중소기업의 한류활용 마케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수출 중소기업들은 한류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국가브랜드 및 인지도 향상(응답업체의 57.0%)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55.7%)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한류의 거시적 영향>

(응답자수, 비율 %)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국가브랜드 및 인지도 향상	69 (57.0)	41 (33.9)	11 (8.9)
콘텐츠와 타 제품의 동반성장	10 (8.3)	31 (25.6)	80 (64.5)
문화적 친밀도 제고	42 (34.7)	49 (40.5)	33 (26.6)
합 계	**121** **(100.0)**	**121** **(100.0)**	**124** **(100.0)**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미치는 영향>

구 분	1	2	3	4	5	6	7	합계
응답자수	31	16	11	39	19	7	8	131
비율(%)	23.7	12.2	8.4	29.8	14.5	5.3	6.1	100.0

주 : 1점(거의 없다) ~ 7점(매우 크다)의 순서로 조사

또 약 60%의 기업이 현재는 한류가 제조업의 수출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응답했지만, 기업 및 제품 이미지 개선 후광효과를 통해 수출증대 효과가 향후 더 증가할 것이라는 대답이 54.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K-POP 과 드라마. 아이돌의 춤과 노래를 비롯해 풀하우스, 가을동화, 아랑사또전 등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드라마가 외국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수출증대를 통해 중소기업을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으로 대표되던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면서 다른 분야의 수익까지 창출해주었습니다.

<수출증대에 영향을 준 콘텐츠>

구 분	영화	K-Pop	TV 드라마	게임	캐릭터	만화	한류 스타	기타	없음	합계
응답자수	0	24	31	1	0	0	11	4	60	131
비율(%)	0.0	18.3	23.7	0.8	0.0	0.0	8.4	3.1	45.8	100.0

한국선진화포럼의 9 월 월례토론회에선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심각성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었는데요.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국가 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급감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여대 선진화 연구모임에선 한국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류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이 제시됐습니다. 전자제품, 조선 등 대기업 중심의 기존 수출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한류 콘텐츠에 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불황으로 외국 소비자가 지갑을 닫아가는 추세이더라도 K-POP 이나 한류 드라마를 통해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다 보면, 화장품 등 소비재나 관광산업 등 중소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산업은 이미 우리나라에 수익을 창출해주는 주요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법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② 김재원(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지난 9 월 27 일 목요일,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68 차 월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어 10 월 8 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숭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 역시 두 번째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불어오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경제위기는 지구적 문제로 확산되었다. 이에 아시아 권역 역시 이런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나라 역시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움직임의 기미를 눈치챌 수 있다.

여러 움직임 중에 대학가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대학 구조조정이다. 경제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대학은 무턱대고 졸업생만 배출해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학도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게 됐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대학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는 본래 기업에 더 적절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대학에 역시 이 용어를 대입시킴으로 인해 대학 역시 언제부턴가 기업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모양을 보면, 취업률이 낮은 학과 혹은 입학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 감축 및 통폐합이 있고,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결국 폐교에 이르는 것도 있다.

반면 취업률을 고려했을 때 전도유망한 학과는 신설하거나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 이 역시 구조조정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취업률이라는 통계자료에 입각하여 정해진다. 여기서 의도치 않은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선진화 연구모임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특정 학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해당학과 학생들에게는 좋은 여건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학교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만큼 타 학과 학생들에게는 지원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 요인은 하나다. 취업률이다. 즉 산업수요를 보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학과들도 있다. 그러나 나름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 학과들의 힘이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사회에 나갔을 때 발휘하기가 여간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들을 위한 수요를 늘리는 것 역시 하나의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예를 들어 A 라는 학과를 졸업하면 반드시 A 라는 길을 가야 하는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국가적 움직임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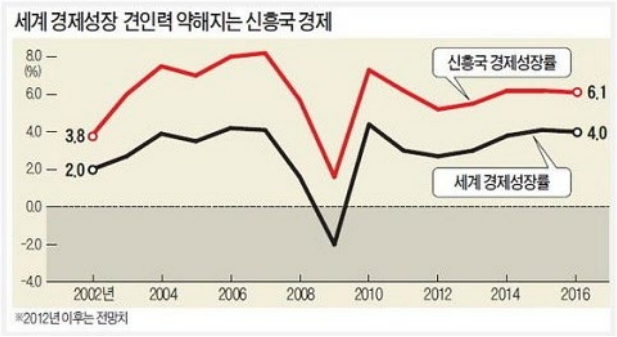
대학 진학률이 이례적으로 높으면서 청년 실업률 역시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선진화를 이룩하는 방법의 길목이 참 많다.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가 헤쳐가야 할 길을 바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완벽하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취업률을 통해서만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변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학을 구조조정 하는 방안보다 더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취업률 향상과 함께 행복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③ 김정원(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세계 경제가 미국 금융위기(2008 년), 유로존 재정위기(2010 년)에 이어 신흥국발 세 번째 위기에 직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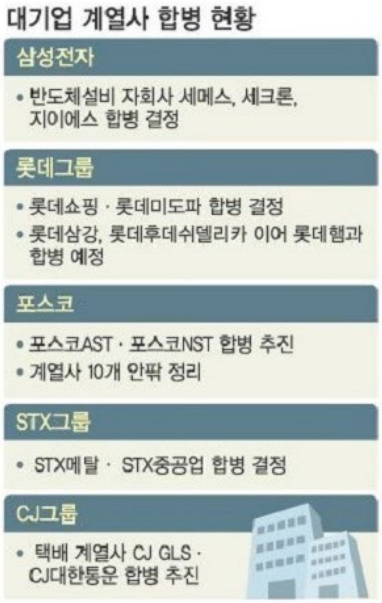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가 세 번째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불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마저 주춤한다면 세계 경제를 견인해야 할 엔진이 멈추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의 경기 둔화가 세계 경제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입니다.



지난 9 월 한국선진화포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경제가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잠재성장률이 낮은데다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있어 향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다가오는'이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사실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이미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서도 그 조짐을 엿볼 수 있는데요. 대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 사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합병하기 시작했습니다. 롯데그룹은 2009 년부터 3 년 간 무려 10 건의 계열사 합병을 단행했으며 내년 초까지 3~4 건의 합병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롯데삼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제과는 롯데제약을 합병시켰고, 롯데 칠성음료도 롯데주류 BG 를 합병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 포스코, STX, CJ 그룹 등 많은 회사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줄줄이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몸집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감축과 인원감축 그리고 자원공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선 이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 규모를 줄이는 것이겠지만, 대학생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몸집 줄이기 피해가 대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좋은 일자리'의 수가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10 월 경북대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좋은 일자리'의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대폭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취업 대란'이 아니라 '취업 대전(大戰)'이란 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취업정보사이트 잡코리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에 취업한 구직자들의 평균 스펙은 토익 852 점, 학점 3.7 점, 어학연수 1 회, 자격증 1.8 개, 인턴경험 1.1 회, 봉사활동 0.9 회, 수상경력 1 회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구직자들은 학점 3.67 점, 토익 841 점, 어학연수 1 회, 자격증 2 개, 인턴 1 회, 봉사활동 1 회, 수상경력 1 회로 나타났고, 현대자동차는 학점 3.8 점, 토익 823 점, 어학연수 1 회, 자격증 2 개, 인턴 1 회, 봉사활동 1 회, 수상경력 2 회로 집계되었습니다. 결론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입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좁아지는 취업문 속에 대학생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스펙과 학점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관문이었고, 대학은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전락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추억은 책상에 앉아있는 것이 전부이고, 청춘들은 대학교를 가서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그 속에서 휩쓸리는 대한민국. 과연 우리의 청춘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선, 일자리의 공급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수요되는 노동인력들을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교육의 체제를 바꿀 때입니다. 국민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낭비는 버려야 합니다. 대학교의 본질을 되찾고 전문인력들을 많이 양성할 때 우리는 세계적 추세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스펙쌓기에 연연하지 않고 학문의 본질과 더 나은 전문인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④ 김화랑(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공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수학·과학에 특출난 사람들, 천재, 한국을 짊어질 수재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 이공계에 진학한 사람들은 이공계 하면, ‘이공계 기피현상'부터 떠올린다. TV 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멘트가 자주 뜬다.



〈출처: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9529〉

"열악한 처우와 연구 환경 때문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은지 벌써 10 년이 훌쩍 넘어간다. 이공계가 죽어감에 따라 한국의 발전 속도는 점점 더디게 되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은 한국의 앞날에 매우 부정적이다. 필자는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업이나 외국자본 유치 등도 필요하지만 '이공계 살리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공계 분야만큼이나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런 현상은 고쳐지지 못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정녕 없는 것인지 실제 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의 토론과 이공계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학부생들은 IMF 외환위기 전후로 이공계의 근로환경 및 수당은 눈에 띄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해결책이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 대부분이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였다.

모 기업에 취직을 하면 30 대 후반에서 40 대 초반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소리는 이공계에 종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이공계 학부생들에게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뿐 아니라 초봉이 박봉이라느니 공부한 것에 비해 대우를 못 받는다느니 하는 불만 또한 흔히 듣게 된다. 혹자는 인문계열·사회계열 전공자들 또한 취업이 힘들긴 마찬가지이고 연봉이 적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공계들만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실제로 이공계 인력은 인문계열·비상경 사회계열 전공자에 비해서는 취업률이 높은 편이고, 이는 현 취업 준비자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출처: http://news.kbs.co.kr/society/2012/04/04/2458719.html>

일단 이러한 이야기에 대답을 하자면, 잘못된 논리에서 나온 잘못된 비교라고 할 수 있다.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이 취업하는 직종과 이공계열이 취업하는 직종은 서로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이공계열이 취업하는 직종이란, 이공계 학부졸업자들이 가는 곳이 아닌 대학원 졸업자, 즉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연과학·공학은 21 세기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발전이 거듭되고 있고 지금도 매시간 책 한 권 분량의 지식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나 겨우 학부에서 배우는 지식 가지고는 실제 연구하는 곳에서 써먹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보통 석사의 경우는 2~3 년, 박사의 경우는 최소 5 년 또는 그 이상이다. 학부를 정말 빨리 졸업한다고 해도 3 년에서 3 년 반, 보통은 4~5 년이다. 남자의 경우, 석사 취득 후 병역특례업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고, 박사 과정 중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보통 학부 학위만 취득한 사람보다 군대 2 년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대학 입학 후 졸업까지 석사는 6~7 년(전문연구요원 기간 3 년 미포함), 박사는 9 년 이상이 걸린다. 남들이 말하는 20 대를 학위를 취득하는데 모두 보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다른 분야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인문계열은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비교대상이 적합하지 않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어떤 한 분야가 적은 소득을 받는다고 하여 다른 쪽도 적은 소득을 받아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출처: http://blog.britishcouncil.or.kr/1151>

사진 속 학사모를 던지는 사람들은 참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공계생들은 웃을 수 없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학위 취득 후 자신이 가는 직종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소득 걱정과 자신이 몸을 담는 곳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고용보장 걱정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한국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IMF 이후로 더욱 심화되었고 현재는 그에 대한 적정 보수를 못 받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며, 한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이공계 살리기'**라는 것이다.

이공계 인력이 느끼는 이공계 기피 현상

먼저 현재 이공계 인력이 느끼는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Naver 또는 Google 등 포털사이트에 '이공계 기피'가 아닌 '이공계'라고만 검색해도 이공계 기피현상과 현재 이공계의 막막한 실태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검색결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2012 년 1 월 24 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공계 기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과학·영재고 학생 650 명과 이공계 대학생·전문대생 1661 명, 대학원 석·박사과정 260 명, 이공계 종사자 194 명, 비이공계 대학생 116 명 등 2881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공계 종사자와 대학생 상당수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이공계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한다(이 조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2011 년 5 월에서 10 월까지 약 6 개월간 심층면접,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이공계에 오랜 시간 종사할수록 이공계 기피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5 점을 척도로 이공계 종사자가 3.79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생(3.63 점), 대학생(3.25 점), 과학·영재고(3.09 점) 순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공계 기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이공계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 빈약'**(3.95 점)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런 답변은 이공계 종사자와 대학원생에서 두드러졌다. 그리고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3.88 점), '**한 일에 비해 보상이 적다**'(3.82 점)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이공계가 아닌 다른 계열의 대학생 역시 이공계 기피원인으로 '**이공계보다 다른 전문직에 대한 사회 선호도가 더 높다**'(4.14 점),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좋지 않다**'(3.67 점)를 꼽았다. 특히 이공계 종사자들은 수입과 고용보장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직장소재지가 대전을 비롯한 지방에 위치한 점 등으로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려면 **정부가 이공계 출신 고급관료를 육성하고, 기술인력을 우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하며,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기업의 경우 이공계 종사자들을 위한 고용보장과 복지후생, 충분한 보상체계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교육기관은 장학제도 확대**, 의사표현 능력교육, 현장실습 교육 등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201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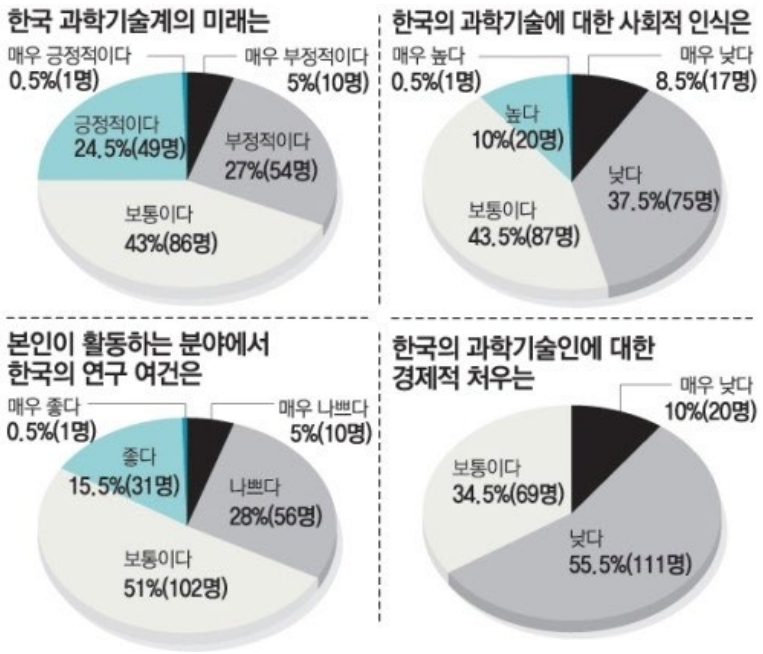
[그림 6] 이공계 박사의 연구지원 및 제도 만족도



한국과학기술기획연구원, 〈 2011 이공계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

위 그래프는 한국과학기술기획연구원(KISTEP)에서 2011 년에 이공계 인력 육성, 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이공계 인력을 대표하는 이공계 박사의 직장 및 연구지원과 제도에 대한 만족도 그래프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위에서 꼽았던 근로소득(보상)과 복리후생임을 알 수 있다. 즉 이공계 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이공계를 애초에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 15 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미 한국에서는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엄청난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자원 하나 나지 않는 국가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인적 자원뿐인데, 훌륭한 인재들을 모셔다 두고 풍족한 대우는커녕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단 소득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의 이공계 인력이 지닌 능력과 그들이 보이는 연구성과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유수 저널에 한국 연구원들이 내는 논문들이 실리고 있고,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지 오래다. 가정은 불필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기초과학 육성이 70~80 년대부터 이루어졌다면 한국에서도 이미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거나 머지 않은 시점에 나올지도 모를 상황이라는 것이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현재 기초과학 육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있기에 자연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15 명이나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이공계를 키우는 방법은 그 분야의 연구장비 연구기관 설립과 같은 연구지원비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공계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 말고는 없다.



〈출처: http://news.donga.com/3//20080421/8569449/1〉

2008 년, 이공계 인력 200 명을 대상으로 이공계에 대한 현 상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공부를 해야 하면서 동시에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는 이공계 인력과 달리, 의사들은 전문의가 되기 전 얻은 지식만으로 직업에 종사한다. 그럼에도 평균 연봉은 의사가 3 배 가까이 많은 현실이다. 의사가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실적을 내는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는 경제적 처우를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업에 대한 직접적인 소비자가 국민 자신이기에 생활하면서 직접 돈을 지불하지만, 이공계 분야의 경우 기초과학 연구결과 및 신기술 개발 등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은 국가와 기업체에서 적절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공계 인력이 자신이 일하는 업종의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하고 사회적 인식이 나쁘다고 대답하는 사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공학 전공자로서는 암담한 현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공계 인력의 근로소득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아래 그림은 이공계 연구인력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의 산실인 대덕 연구단에서 종사하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이끌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곳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연구원 가운데 정규직은 47.3%뿐이고 **절반이 넘는 52.7%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1 년 후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구에만 몰두한다는 게 가능할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구성과를 내고 한국의 기초 과학기술을 책임진다는 것을 정말 신기하게 여겨야 할 정도이다.



KBS, [심층취재] 〈 이공계 연구인력, 절반이 '비정규직' 〉

최근 나로호 발사 연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우리 기술로 로켓 하나를 만들거나 쏘지 못해 러시아에 의존하다 두 차례의 실패를 겪었고 마지막 남은 기회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실력 있는 예비과학자가 돈 안 되는 이공계를 기피하고 돈 되는 의료계, 약학계를 선택하는 현실부터 개선돼야 한다. 돈이 중요한 사회에서 "돈 포기하고 과학에 대한 열정으로 국가 기술발전에 기여하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절반이 넘는 이공계 인력이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상황에서 나로호 논란과 같은 불편한 일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제대로 된 대우 없이, 제대로 된 미래보장 없이 국가를 위하여 이공계로 진학하고 이공계에서 종사하라고 하는 말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가혹한 말이다. 물론 이공계를 택한 모든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공계 인력을 키우는 것을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이루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경제가 어려울수록 근시안적인 해결책보다는 수 년 후, 수십 년 후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해답 중 하나는 쓰러져 가는 이공계를 지금이라도 살리고 그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공계에 대한 지원이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10 년 후 대한민국에서 이공계 직종은 블루오션이 될지 모르겠지만, 후배 양성을 하고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는 인력들이 부족하게 되는 형국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 국민들에게 이공계로 가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가·기업 차원에서부터 이공계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나와야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⑤ 나민아(전남대학교 경영학부)

물가. 뉴스,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물가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 아나운서들이 거의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달 물가상승률은…….” “물가상승이 지속되어…….”



"물가하락"이란 말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번에는 얼마나 올랐나’라는 생각과 함께 ‘에휴. 맛있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못 사먹겠네’라며 한숨을 내쉬곤 하죠. 그렇다면 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기만 할까요? 물가가 무엇이길래 소비자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글쓰기에 앞서, 물가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란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묶어 이들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각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물가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연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큰 태풍이 두세 차례 지나가면서 많은 과일들이 낙과가 되고 상추, 깻잎 등은 비바람에 휩쓸려 가버렸죠. 특히 9 월엔 추석을 앞두고 있던 터라 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금”배추, “금”상추라 불리는, 평소 가격보다 두 배나 비싼 채소를 샀어야만 했죠.

추석을 앞두고 엄마를 따라 장을 보러 간 저는 “아이고, 채소값이 이리 비싸면 다른 것은 어떻게 사 먹나. 제사상은 차려야 되니까 안 살 수는 없고 못 살겠네”라는 아주머니들의 한탄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개당 600 원이던 파프리카의 가격이 태풍이 지난 후 개당 2000 원으로 뛰어 오른 것을 보며 저는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물가상승의 요인으로는 이란의 정세불안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석유가격의 불안정을 들 수 있습니다. 석유는 어느새 물과 같이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연 석유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기계를 작동시키거나 차를 운전하고 요리를 할 때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석유는 필수요소가 되었죠.

하지만 이란에선 지난 7 월 유럽연합의 이란산 석유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한 이래 석유 수출량이 30% 이상 감소하면서 예산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메우고자 이란은 고의적으로 리알-달러 환율 인상 조치를 취했고 결국 이는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면서 소비자에게 가는 최종재의 가격 또한 오르게 되어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적 환경, 정치 • 사회적 환경 같은 이러한 거시적 환경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되었다는 것에 사람들이 단기간에 다시 이를 하락세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우선 그보다도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저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지, 원래 습관적으로 구매하던 제품들의 수도 줄여야 할 판이지……. 돈을 더 축적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면 힘든 노동 끝에 돌아오는 것은 결국 싼 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이었습니다. 가게에서조차 물가상승으로 인해 손님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듦과 동시에 식재료의 가격 그리고 부동산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한 달의 순매출액으로 인건비까지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한 만큼 아르바이트비를 더 받고 싶은데 뭐 별 수 있나요. 서로 힘든 사정이니만큼 이렇게 감당하고서라도 돈을 벌어야죠. 저도 소비는 하고 살아야 하니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물가 상승을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일이 많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갈 때도 그러한데요. 개강 첫날, 식당에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아니 이럴 수가! 제 눈 앞에 보이는 것은 3 개월 만에 가격이 1000 원이나 인상된 메뉴판이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500 원이 인상되었을 땐 '뭐, 이쯤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1 년도 채 되지 않아서 총 1500 원이 인상된 가격을 보고 눈이 휘둥그래 떠졌죠. "이모~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어요? 너무 비싸요"라고 식당 종업원 아주머니께 여쭈어 보았더니 "나도 안 올리고 싶은데 가게 유지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채소값이랑 전기세랑 계속 오르니 원……"이라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물가상승이 여러 사람을 속상하게 합니다. 소비자들은 평소 구매하던 물품까지도 줄여가며 소비를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 공급자들은 수요를 맞추지 못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겠지요.

한 경제 전문가가 그러더군요. 계속되는 물가상승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를 다시 원상태로, 즉, 하락세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요. 더군다나 물가는 환율과도 관계되어 있고 크게 보면 세계 전체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만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제화 시대이니만큼 서로 분쟁과 갈등보다는 화합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⑥ 송민영(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이화여대 선진화 연구모임을 통해 경제위기의 대처방안에 대한 결론 중 하나가 인문학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 68 차 월례토론회에선 경제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거론됐는데요. 취업률을 기준으로 함량 미달의 학과, 혹은 대학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모임에 참여한 이화여대 학생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저는 인문학이 인간의 창의성 발달과 삶을 돌아보게 해줌으로써 경제에 기여하는 면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인문학을 인간의 조건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조건'이란 동물과 구별되는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요즘은 도시의 번화가에서부터 골목길까지 커피숍이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커피는 기호식품으로서만 각광받는 게 아닙니다. 커피와 커피숍의 인기 비결엔 '문화 마케팅'을 하는 인문학적 창의력과 감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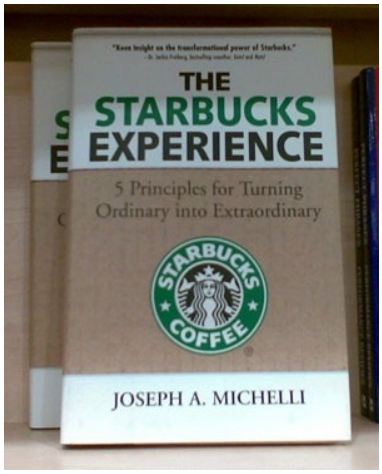
2009~2010년 커피 브랜드별 매장 수 증가 현황 (단위:개)

브랜드명	2009년 11월	2010년 11월	매장 증가 수
카페베네	88	415	327
엔제리너스	200	327	127
던킨도너츠	730	846	116
이디야커피	336	405	69
할리스커피	209	258	49
투썸플레이스	52	100	48
스타벅스	307	351	44
탐앤탐스	149	172	23
커피빈	182	203	21

*자료:업계 및 월간커피 11월호



커피숍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스타벅스나 커피빈을 꼽는 대답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도 매우 높은 편이죠. 이 두 브랜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커피 맛이 좋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문화 마케팅'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들 업체가 다른 커피숍과 비교해 어떤 문화를 어떻게 더 잘 팔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하면 초록색, 인어 얼굴이 그려진 로고, 스타벅스 매장 내 특유의 분위기가 연상되곤 합니다. 여기에 더해 1970 년대 시애틀에서 만들어진 커피 전문점이라는 나름의 역사를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스타벅스만의 매장 분위기는 마니아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스타벅스는 수많은 전 세계 매장이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도록 인테리어에 공을 들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원목을 활용한 각종 집기와 은은한 조명, 커피 볶는 향과 친절한 고객응대 등의 요소는 스타벅스를 커피를 사서 들고 나가는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 문화 향유지로 탈바꿈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타벅스와 그 브랜드의 발상지인 시애틀 사이의 연결고리 또한 서구식 문화와 분위기를 선호하는 한국 여성에겐 어필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매장 내 분위기와 스타벅스-시애틀의 연결고리가 안락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하나의 문화를 창조한 것이 이 업체가 글로벌 커피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빈 또한 문화를 통한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커피빈 매장에 들어가면 다른 커피숍에는 없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걸려 있는, 커피빈을 들고 파파라치들에게 사진을 찍힌 할리우드 스타들의 모습이 그것인데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 커피를 즐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자신도 함께 즐긴다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를 패션 아이템처럼 활용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가 단순히 액상 카페인 음료가 아닌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된 문화, 커피숍 자체에 문화의 의미를 불어넣기보단 커피빈의 커피에 문화를 불어넣은 것이 이들의 커피 '문화 마케팅'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이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제적으로 뻗어나갈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던 중 이대 근처에 2000 년대에 생긴 비교적 신생 커피숍인 폴 바셋이 오픈을 해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커피숍 또한 호주계 바리스타가 설립했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저도 10 월 18 일 폴 바셋이 직접 와서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기다리는 동안 이 브랜드의 성공요인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 또한 '고급 커피'라는 문화를 팔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다른 커피숍에 비해 높은 것도 아니고 매장이 더 화려한 것도 아니었지만 챔피언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를 맛보는 상류 사회의 일부가 된 듯한 문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흔히 커피를 아는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라고 일컫는, 달지 않은 커피다운 커피가 주를 이루는 메뉴를 보며 이 커피숍 브랜드가 '커피를 아는 사람이 마시는 커피'라는 이미지와 문화를 전파하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강남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가보면 이러한 상류 사회의 문화의 일부가 되기 위해 새로 생긴 폴 바셋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커피숍들, 엔제리너스와 이디야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커피숍 모두 최근 급격하게 국내에서 체인점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커피 브랜드로 명성을 쌓을 수 있을 지 의심스럽습니다. 엔제리너스와 이디야,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엔제리너스라 하면 천사로 대표되는 로고, 광고모델인 김수현이 떠오르고, 이디야하면 파란 로고와 비교적 싼 가격이 떠오릅니다. 이 두 브랜드 모두 문화를 창조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한 스케일로 진출을 할수록 타 브랜드와 차별성을 위하여 특정 지역의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전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공동의 가치를 표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커피숍들은 이러한 면이 아직 부족합니다. 혹시 체인점 늘리기, 매출 올리기 등의 금전적인 이득에만 집중하느라 인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 인문학적인 측면을 무시한 것은 아닐까요?



사는 것이 각박해지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이 될수록 사람들은 문화에 의존합니다. 바쁘게 회사에 가는 길에도 거리의 '지금 살고 계신가요?'와 같은 낙서에 눈길이 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인문학이

딱딱한 역사, 철학,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서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과목들이 인간의 문화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곧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사업의 번영의 핵심이 되어 결국은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적 상황을 보고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발 앞을 내다보아 인문학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⑦ 윤보라(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한민국의 영화감독이 또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집안의 가난함 때문에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 '초졸 인생'을 살아갑니다. 청계천 밑바닥에서 노동자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영화 〈양들의 침묵〉을 보게 되고, 그는 32세의 나이에 영화감독을 꿈꾸게 됩니다. 그 후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 길거리 화가생활도 하며 영화를 배우게 되고 1996년 본격적으로 영화감독으로서 데뷔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청계천 키즈의 대변신이었죠.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인정받아온 영화감독, 그의 이름은 김기덕입니다.

해외에서는 명장, 국내에서는 이단아?

지난 9월 8일 김기덕감독이 영화 〈피에타〉로 제 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최고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피에타〉의 황금사자상 수상은 세계 제 3대 영화제라 불리는 프랑스의 칸 국제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국제영화제, 이탈리아의 베니스 국제영화제 중 베니스 영화제에서 한국 최초로 받은 상이므로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사실 이번 〈피에타〉 수상 이전에도 역시 김기덕 감독은 화려한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영화 〈섬〉,2004년 〈수취인불명〉으로 베니스 영화제 공식 경쟁부분에 후보작으로 입성했었고, 2004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빈 집〉으로, 같은 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사마리아〉로 감독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죠. 후에 2011년 칸 영화제에서는 〈아리랑〉을 통해 '주목할만한 시선 상'을 수상했으며, 올해인 2012년에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감독으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처럼 해외 저명한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아온 김기덕 감독이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김기덕 감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습니다. 그를 한국이 낳은 세계적 거장이라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한 편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계의 이단아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김기덕 감독이 이단아로 평가 받은 이유에는 파격적인 영화소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영화 속에서 그려내고자 하는 세상은 보통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랑, 행복, 가족애와 같은 감정들과는 사뭇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보편적 아름다움'보다는 사람들이 직면하기를 꺼려하는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영화를 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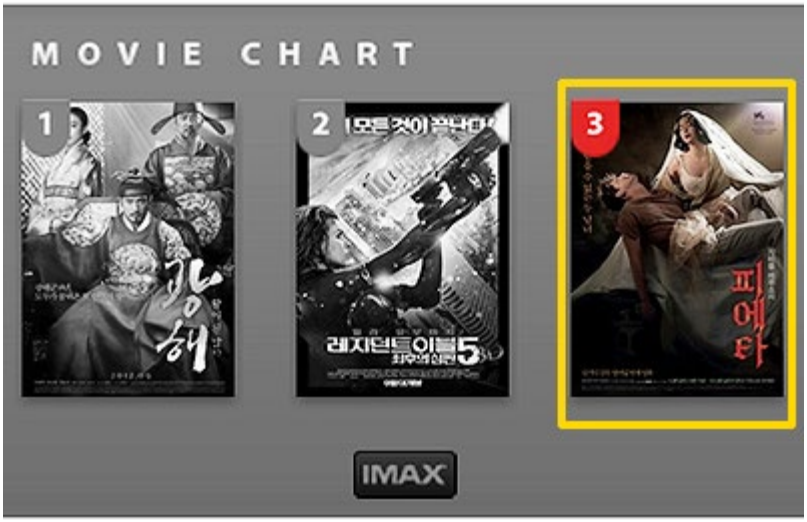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한 그의 영화는 대중의 시선을 끌기엔 충분했지만, 그들의 발길을 끌기에는 부족했었습니다. 자연스레 그의 영화는 흥행에 실패하게 되고, 김기덕은 해외에서는 인정받는 감독이지만 국내 영화 팬들에게는 외면받는 비운의 감독이 되고 맙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는 인간의 폭력성이 가감 없이 드러나고, 특히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여과 없이 그려져 많은 여성들로부터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기덕의 영화 속 여자는 성녀와 창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김기덕은 지극히 남성적 시선에서 여성을 그려내 여성을 도구화한다.' '김기덕은 여성을 대상으로 본인의 열등감을 표출한다.' 등등 김기덕 감독은 유독 여성과 관련된 비판을 많이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황금사자상, 그를 바라보는 시선의 터닝포인트가 되다

하지만 최근 김기덕 감독을 향한 평단의 평가와 대중의 평가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부터 그의 영화 속에 내포된 감독의 메시지를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사실적이란 이유로 외면하기만 했던 대중들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극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가 관객 30만을 돌파하며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많은 사람들이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렇다면 김기덕 감독의 황금사자상 수상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람들이 장르를 넘어 소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내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비용을 문화예술에 소비하고 있지만, 그 분야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만을 보고싶어 했다면, 이제는 '직면해야 할 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세계, 사회적 모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 사회적 문제 등을 직면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변화는 훗날 우리들이 지금보다 폭 넓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기덕 감독은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의 세계로 뛰어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청계천 키즈라 불린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늦었다면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32살이 되어서야 영화감독의 꿈을 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되도록이면 어린 시절에, 남들보다 앞서서 꿈을 이뤄야 하고 그래야만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특히나 요즘 사회는 정해진 궤도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예외'를 허용치 않는 엄격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은 궤도를 벗어난 예외도 꿈을 이루고, 이른바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해야만 했고, 정석 코스를 밟은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분야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희망을 잃고 꿈을 외면하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과 가치, 그리고 예외가 존중받는 사회

김기덕 감독은 확실히 주류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 그는 비주류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정석 교육 코스를 밟은 사람도 아니고, 국내 유명 영화 배급사의 지원을 받고 제작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충무로에 이렇다 할 인맥이 있지도 않았고, 학벌을 근거로 끌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보편적 소재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지도 않았을뿐더러 평소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의 영화 홍보에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을 내세워 세계인들과 조우했고, 국내 영화 팬들의 발길을 돌렸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다양한 가능성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 생각합니다. 김기덕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수많은 패배자가 등장하는 작은 수직사회가 아닌, 작은

수직사회가 모여 큰 수평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대 권력의 독과점 횡포가 아닌 작은 가능성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사회, 이것을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선진국 아닐까요? 김기덕 감독에 대한 재평가의 시작은 곧 작은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외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화를 기대해봅니다.

⑧ 이철우(청주대학교 무역학과)

'멘토제'를 도입해 화제를 낳았던 MBC 오디션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의 여파 때문이었을까요? '멘토'라는 단어가 사회에서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을 말합니다.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이들은 불안한 미래에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을 받기 위해 멘토를 찾아서 강연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멘토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엔 한계가 있습니다. 앞날의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선 본질적으로 본인의 노력이 가장 절실합니다.



멘토에만 의존해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우리나라 경제도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입, 바로 대외무역의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아 경제력도 작고, 지하자원 역시 없어서 물건을 만들어 외국에 팔아 이익을 남겨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2011년 기준으로 110.30%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말이지만 반대로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면 곧바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저성장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지장을 주어 피해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전까지 한국경제에 있어 수출은 신화적인 존재였고, 수출 주도 성장모델은 내수중심 성장모델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더 이상 국내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 위주 성장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의도했던 낙수효과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악화, 중산층의 붕괴, 저소득층 증가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더 성장하고 나머지는 더 힘들어지게 하는 양극화를 심화 시켰습니다.

현재 높은 대외의존도와 취약한 내수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외세의 힘에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경제 구조 특성상 우리나라는 무역 없이 즉 대외 의존 없이는 성장과 유지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대외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낮추고, 동시에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검토중인 내수활성화 주요 방안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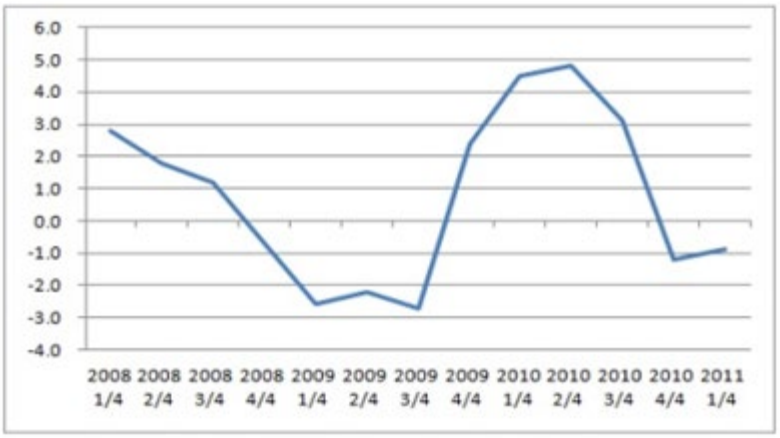
공공부문 근로시간 조정	공공부문 출퇴근 시간을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전환
초중고교 방학기간 조절	봄·가을 방학 신설
대체휴일제 도입	징검다리 연휴시 공무원 연가 활용 권장 및 연가보상비 지급 일시 폐지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현행 신용카드 공제한도(300만원)를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선 확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영업시간 제한, 제도 도입 논의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제정	전통시장 체험 기회 확대 등으로 시장 매출 증가 기대
공공부문에 중소 MRO 업체 우대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업체 배제
4대강 수변관광 및 해양관광 활성화	자전거길 등 육성,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수상레포츠 육성

자료 : 세계일보

제출된 방안들 중 핵심적 방안 중 하나는 *공공 부문의 근무시간을 '9시 출근 6시 퇴근'에서 '8시출근 5시 '퇴근'으로 조정, * 대체 휴일제 도입, * 봄, 가을 방학 신설 등으로 여가시간을 늘려 국내 소비를 확대 하자는 것입니다. OECD 선진국 대부분 적은 노동시간과 그 남는 시간을 각종 취미 생활이나, 여행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그렇게 되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면 정책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생길지 의심이 듭니다. 여가시간을 늘려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분명 좋은 접근이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소비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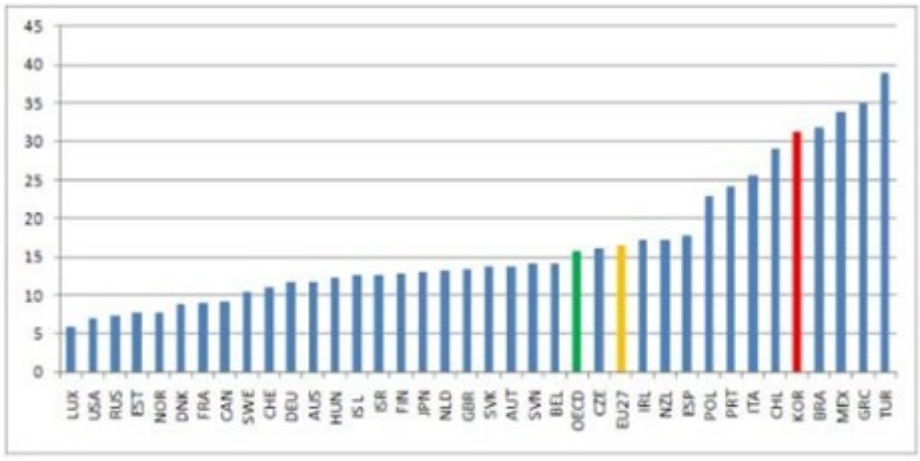
지금과 같이 저임금에, 소득이 정체되어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수위에 다다랐고, 저축여력이 미미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구매력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가계 월평균 실질 소득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2인이상 전국가구)
자료 : 통계청

결국 먼저 국민들의 소비지출(구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선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적정수준의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계소득의 대부분은 임금소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은 최저임금조차 잘 주지 않고, 심지어 입사 후 1~2개월은 트레이닝 기간이라 하여 더 적게 줍니다. 이런 불법적 노동착취를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대기업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수출을 통한 이윤을 많이 남기면서 그 이익을 주주에게만 돌려줄 뿐 노동자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역시 정직원보다는 시간제, 기간제 등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주요국의 자영업자 비중(2008년) / 자료 : OECD FACTBOOK 2010

또한 자영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SM의 골목상권의 진입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는 곧 서민층 붕괴, 구매력의 악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먼저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 미달, 불안한 고용, 가파른 물가상승 등의 상황에서는 국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유력 후보들 간에 경제 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관심에 쏠려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상황이 심각하다고 실제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현재 내놓은 정책들이 겉만 번지르르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것들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 믿고 싶습니다

⑨ 장민영(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며 국가 경제가 급속히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지난 추석에도 선물세트 판매가 매우 부진했으며 백화점을 찾은 고객도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지금, 저희 대학생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어떨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이고 육체적 노동강도가 덜해 비교적 일이 힘들지 않은 아르바이트는 금방 자리가 차고, 알바 면접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청소하고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도 경력을 본다고 하더군요. 알고 지내던 후배가 이번 추석을 다녀오기 전에 부모님께 용돈을 자꾸 더 받아쓰게 되는 것 같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결국 몇번 떨어지고 크게 낙심한 상황을 봤습니다.

제가 1학년 학생일 때만 해도 학교 근처 돈까스집이나 김치찌개집 식사 가격은 40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밥값 담합이라도 하는지 일제히 6000원으로 올리더군요. 볼펜이나 학용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근처라는 이점을 노리고 시내 대형 문구점보다 제품 가격을 비싸게 파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학생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금액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면 되지 않냐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이제는 장학금도, 아르바이트도 모두 다 해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로문제, 고대생의 1순위 불안 요인

4학년이 되면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더 실감이 납니다. 갈수록 면접은 더욱 어려워지고 시험은 더 까다로워져만 갑니다. 전공은 상관없이 회사에 그냥 들어가고 비전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을 알아보고, 인성검사 시험을 미리 대비합니다.

저희 학교 취업 센터를 가보았습니다. 실제 이번 공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기업들의 추세가 어떤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최근 취업센터에서도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들의 공채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취업센터에서는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경제가 어렵다고 채용을 줄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인재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은 공채를 내더라도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인재를 찾으려고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토론하는 내내 중소기업이 힘들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대학생들 자신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것이 또 경제위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기업들은 대학생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조금만 더 손을 내밀고 관심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은 좀 더 대학생이 강하고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⑩ 정해경(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2012 년 9 월 27 일,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제 68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위기. 지난 10 년 간 우리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수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월례토론회에선 유럽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현재의 세계 경제위기가 유럽 각국의 부채상환이 미루어지는 이상 완전히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산업혁명과 금융업의 발달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탄탄한 경제구조를 갖춰온 유럽과 미국에서조차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다가오는 경제위기 그 해결 방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10 월 10 일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은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학생들이 제시한 방안은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경제성장입니다.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 관계를 중시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보다 중소기업 발전을 통해 자국의 내실을 튼튼히 하는 편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최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상생**'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닌데요, 실제로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서 유출해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한 학생의 경우, 자신이 언젠가 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날 정해진 납품 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하청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 매일 밤샘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주는 대기업은 한정되어 있고,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하청업체는 많으니, 당연히 대기업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그 희망을 보여준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주)포스코건설입니다. 지난 2010 년 동반성장정책이 시행된지 2 년 만에 포스코는 세일 ENC, 유영정공, 세코, 포스콘 등의 협력업체와 멕시코, 베트남 등의 해외동반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포스코 ICT 와 같은 경우, 포스콘과 합병한 포스코 계열의 IT 전문기업인데요, 포스콘과의 합병으로 인해 포스코의 철도사업과 같은 엔지니어링 부문 매출이 발생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 년 상반기 매출은 약 3604 억 7000 만 원으로 **전년대비 108.1% 증가**, **순이익은 92.9 억 원으로 흑자전환**을 하였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해외 제철소 시스템을 구축하며, 건설·철도·발전 사업에도 동반 진출을 하여 중소기업과의 시너지를 높일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나가는 상생의 '좋은 예'를 국내 산업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해외동반진출은 해당 기업만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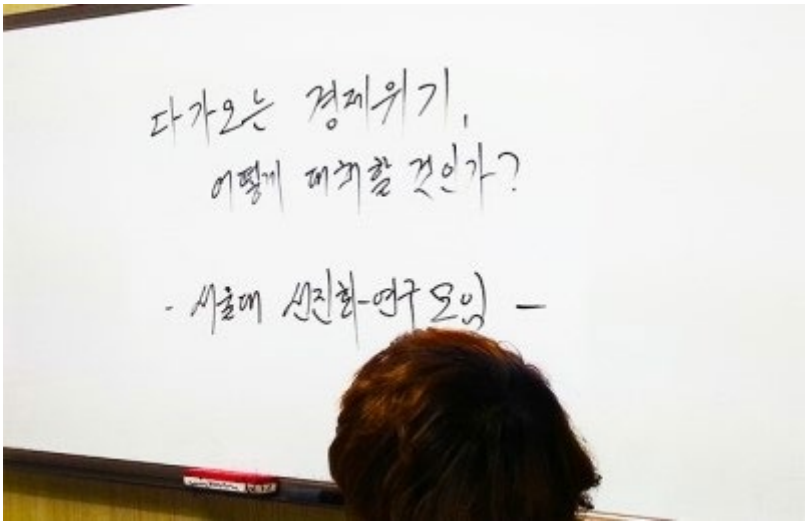


‘현상은 복잡하나, 본질은 단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물가가 폭락하고, 부채는 쌓여만 가고,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제이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수출 중심의 우리 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잘 다져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과 높은 기술력, 중소기업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어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지난 10 월 11 일 목요일,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학우들은 재료공학부 건물 근처 해동학술관에 모여 선진화 연구모임을 가졌습니다. 공대학생의 시각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대주제로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이공계 대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경제위기가 이공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 토론 주제 〉

김화랑: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 사회를 맡게 된 김화랑입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연구모임의 주제는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다가오는 경제위기’라고 하면 현재는 경제위기가 다가오지 않은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도 유럽과 미국발 경제위기에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주제를 좀 더 명확히하기 위해 토의를 한 결과, 이미 다가와버렸을 지도 모르는 경제위기가 이공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공계 산업은 지난 1997 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많은 관련기업들이 도산하였고, 상당수의 이공계 인력은 졸지에 직업을 잃고 실직하는 상황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성해: 이공계 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육성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공계 산업을 부흥시켜야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그러한 시절을 지나 이공계 산업이 IMF 이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현재는 의대에게 매우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무원이나 의사와 같은 직업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특히 의사는 고수입 직종이다 보니 불안정한 이공계 산업에 비해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입시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공계 인력이 아직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다시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면 이공계 산업이 또 휘청거리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우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바라보면, IMF 당시는 국가적인 재정이 매우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기업이 줄도산을 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대부분 이공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공계 산업이 크게 망가졌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한 번 IMF 재정위기를 겪은 이후로 외화보유고를 매우 늘리는 정책을 택하였고, 국가 재정이 현재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흔들릴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즉, IMF 사태와 같은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다른 인문·사회계 인력의 취업난에 비하면 이공계 인력의 경우 취업은 잘 되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준비 중인 4 학년 분들께 여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조근우: 장우제 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에 비하여 이공계 인력의 취업이 쉬운 것도 사실이고, 이공계 분야의 일자리가 훨씬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공계가 공부하고 연구한 것에 비해 대우를 못 받는 것 또한 사실 아닌가요? 현재 이공계의 상황은 대학원에 가지 않는 이상 자신의 전공을 거의 살리지 못하고 취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대학원에 간다고 하면 20 대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 10 년 간 학생 신분으로 지내야 하는데 학비와 생활비로만 해도 엄청나게 드는 현실입니다. 학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물가도 점점 올라가는 상황에서 경제위기까지 오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이공계 인력의 취업은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공계 분야도 취업이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다른 계열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은 우리보다는 취업하기 쉬우니 참아야 된다는 식이면 누가 공부를 하고 누가 연구를 하겠습니까?

강민상: 저도 조근우 님의 의견이 동의합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한 번 겪은 후로 공학, 자연과학이나 인문학과 같은 학문적인 분야로는 성공하기 힘들고 법조계, 의료계로 국가의 수재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로스쿨, 의치전 등이 법대와 의대를 대신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경제위기 이후로 사람들 인식이 도전보다는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현실은 점점 일본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일본 경제가 왜 현재 이 정도로 망한지 아시나요? 기초과학 분야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은 앞서가고 있었으나, 일본도 수 년 전부터 도전보다는 안정을 중요시하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라는 것은 한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곪아 있는 상태에서 주변 국가들에서 문제가 터지면 함께 터지는 것이 바로 경제위기입니다.



〈 반대팀 의견 교환 모습 〉

김화랑: 네, 강민상 님께서 일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 의해 일본이 경제적으로 붕괴되었는지 알려주시면 훨씬 토론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이공계 분야는 한국보다 처우가 나은 것으로 생각되고, 또 기초과학 분야나 공학 분야에 있어서는 노벨상도 받는 등 한국에 비해 아직은 앞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상: 네, 일본의 노벨상 수상 현황을 보면 다른 분야는 제외하고 자연과학 분야만 해서 13 명, 그리고 최근 받은 노벨 생리의학상 분야까지 합하면 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한 명도 없지요. 그러나 알려진 사실과 달리 일본도 기초과학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한 역사가 오래되었고, 한국에 비해 투자한 정도가 수십 배로 차이가 나서 그렇지 현재 일본도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동경대를 포함한 명문대 몇 군데를 제외한 이공계는 의대에 밀리는 실정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이공계 육성을 위해 그에 대한 처우를 잘해주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임미경: 강민상 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공계 육성을 위해 다른 분야에 비해 이공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동의를 하기 힘듭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연구모임 모두가 공학 전공이라고는 하지만 공학이 다른 학문에 비해 정말 월등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문마다 인류에 끼치는 영향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장점이있고 어떤 학문이 다른 학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데 너무 다른 학문을 무시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공학분야 사람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 수입이 많아야 한다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우정: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학문은 소중하지만 학문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은 경제학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이 소중하다고 하여 돈을 모두 같게 주는 것이 어찌 논리적이라는 것인지요?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것이 각기 다르고 그 중 더욱 필요로 하고 그 분야에 희소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분야에 투자 비용이 높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공계 인력이 넘쳐나느냐, 그것은 전혀 옳지 않은 소리입니다. 이미 10 년 전부터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이 시작되어 현재 이공계 인력은 엄청난 부족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몇 뉴스만 검색해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이미

주요 분야의 이공계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에 아직도 국가 차원, 기업 차원에서는 이공계 인력에 대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영보: 잠시 토론이 다른 방향으로 새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위기가 이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토론 아닌가요? 물론 이공계에 대한 처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공계만 더 좋게 해주자는 말은 너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공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화랑: 네, 한영보 님께서 토론의 방향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이공계 인력에 대한 대우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경제위기가 한국 사회에 도래하였을 경우 이공계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이러한 상황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라 님께서 다시 토론을 이끌어 주십시오.



〈 찬성팀 의견 교환 및 사회자모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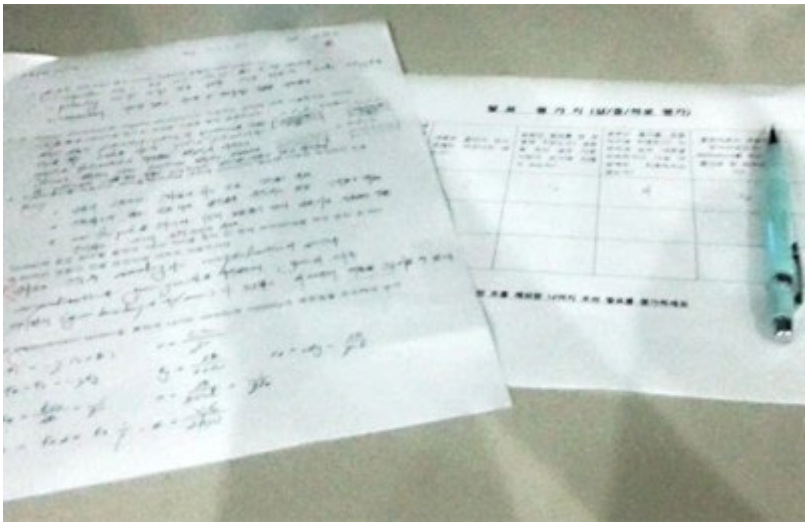
김영라: 우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제위기가 왔다고 해서 이공계의 처우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공계가 대책을 세운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먼저 정해주어야 하는 사항이죠. 동종업계 이직금지와 같은 이공계 죽이기 친기업 정책이나 펴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공계의 미래가 보이기나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이공계 관련하여 컴퓨터 산업이나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분야 연구하는 분들 또한 대부분이 이공계 전공하신 분들인데, 뭣도 모르는 분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셧다운제나 시행하고 있고 게임은 이 나라를 망친다는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뭐 제대로 돌아가기나 하겠습니까? 경제위기가 오든 오지 않든 한국의 이공계는 미래가 없어요.

장우제: 조금 수위가 센 발언이지만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책을 세운다는 분들이 이공계를 너무 부려먹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킬 분야는 이공계 분야밖에 없는데, 특히나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이공계에 대한 처우를 더 좋게 해야 이공계 분야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너무 바로 앞만 바라보고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희서: 하지만 경제위기가 이미 닥친 상황에서 이공계만 처우를 개선시킨다면 다른 분야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각 분야에 투자 비용을 계산해본다면 이공계 분야의 투자 비용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취업 상황 등을 살펴본다면 이공계에 대한 대우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성해: 그것은 딱 그 사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투자비용이 크다고 하여 그것이 모든 이공계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나요? 그렇다면 전체 분야에서 이공계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공계라 함은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를 아우르는 말인데 이 분야를 제외하면 어떤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벌일 건가요? 어떤 분야든 기반이 제대로 닦이지 않으면 어쩌다 겨우 위기를 모면하더라도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쓰러지는 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조근우: 옳습니다. 경제위기라는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사태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대비책 중 하나가 이공계 전문 인력 육성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1% 수재들이 모두 의전, 로스쿨 등으로 그리고 똑똑한 인재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대우를 똑바로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대우를 해주라는 것이 아닌 성과를 냈을 경우에 대한 대우와 그들이 공부하고 연구를 할 때 보장해줄 것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투자에 비해 더 큰 것을 국가에 안겨줄 텐데 이공계 육성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 토론에 관한 자료 조사 및 토론 평가 〉

김화랑: 좋은 의견입니다. 이공계 육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이라고 본다면 확실한 수입을 안겨줄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경제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면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영보 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한영보: 이미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닥쳤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이공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광범위한 대답이라 확실히 와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 사이에서 먼저 공론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전공자들 또한 법 공부를 하여 정치나 법조계로 참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이 이 분야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서: 경제위기라는 것을 일단 벗어나고 나서 이공계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는 게 제 처음 생각이었는데 토론을 통해 조금 바뀐 점이 있습니다. 기반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힘들 때나 경제가 잘 풀릴 때나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인재가 모일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저도 사실 인재들이 모두 수입이 높은 분야로만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수입을 줄이고 우리를 올리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고, 그들의 수입 만큼 우리도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어야 이공계가 육성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공계 분야 육성이라는 게 말은 참 거창하지만 사실 좋은 인재 풀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노우정: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실상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국가나 기업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에 대해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공계도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되겠지요.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 닥쳤더라도 그에 대한 대우를 잘못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정말 한치 앞만 내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IMF 사태처럼 이공계 인력을 해고시킨다거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과학 분야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도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이공계에 대한 처우는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화랑: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가 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위기 사태가 이공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공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계속해야 앞으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궁극적인 토론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전공이 이공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공계에 치우친 발언이었나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이공계가 아니라면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없기에 좋은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학 전공이지만 이공계가 아닌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도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은 시험기간에 열게 되어 정기적인 토론회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되는 분들만 모여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진화 연구모임 2 회 주제는『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경제위기라는 주제가 너무 포괄적인 면이 있어, 대학생들이 보는 구체적인 경제위기에 대해 논해보고자 주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취업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경제위기가 대학생들의 취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 또한 어떤지 이야기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장민영(북한 3) :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이 벌써 2 회를 맞게 되었네요. 저는 선진화포럼 홍보대사 10 기 사회를 맡게 된 북한학과 장민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의 큰 주제는 보시다시피 유럽 재정위기와 맞물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두 경제학과도 아니고, 전문적인 경제 지식에 대해 잘 모르는 만큼,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느끼고 있는 경제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논해보고자 합니다.

박상협(환경공학 1) : 저는 요즘 대학생들이 알바를 반드시 해야 할 만큼 재정적인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장학금 가지고 밥을 먹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국가장학금 제도가 등록금내에서만 지급되어 지고, 저희는 또 다른 생활비가 필요한 것인데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밥만 먹는다고 해도 부모님께 눈치가 보일 정도로 돈을 쓰게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립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대학생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요.

채정실(경제 3) : 역시 취업난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취업률 운운하시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대학생들은 가장 와닿는 주제입니다. 당장 내년에 졸업반인 입장에서

저성장이라는건 필연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거의 없고 환경자체가 압박되는 분위기니까요... 부모님 세대의 조기퇴직 또한 문제에요. 가계경제가 부실해지고 그에 따른 학자금 대출, 사회에 나가자마자 빚더미에 앉게 되는 대학생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취업도 못했는데 빚쟁이라니 너무 답답합니다.

김이환(북한 4) : 저도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대학생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데 요즘 분위기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취업을 위해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취업의 문은 점점 작아져만 가고 있어요. 저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줄인다는 말은 저도 공감합니다. 때문에 세계경제가 당장 앞으로의 제 5 년을 바로 뒤흔든다는 말이 맞겠네요. 고부가가치 산업을 제외하면 일반제조업 비중에선 기업들이 대부분 긴축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송경민(공공행정 4) :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생들이 솔직히 경제를 체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분명하게 체감을 하겠지만 대학생들이 체감할 정도 만큼 경제가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든 정도? 혹은 식비가 올랐다 정도겠지요. 부모님의 돈을 받아쓰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느끼기 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대학생들이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세계경제를 뉴스만 보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일 같아요. 당장 이자율이 낮아졌다고 절망하는 아이들도 없을 것이며 주식 때문에 땅을 치는 아이들도 없을텐데 저희가 논하는 건 정말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민영(북한 3) : 처음엔 경제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것에 의아했는데 정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 속에 놓여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경제가 어렵다고 당장 부모님이 용돈을 줄인다거나 아르바이트 보수가 줄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고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송경민(공공행정 4) : 정말 자신이 주체가 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대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의 어려움은 그때서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 실업으로 대학생을 본다면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이야 말로 피부에 와닿는 경제를 논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박상협(환경시스템공학 1) : 그래도 물가도 오르고, 일정한 용돈으로 생활 전반을 시작하게 된 대학생들이 느끼는 경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식비가 올라 야식을 줄이게 되고, 비싼 밥을 먹을 때는 아차 싶기도 하는거죠. 물론 풍족한 용돈을 받고 사는 아이들은 다르겠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용돈을 아껴가며 대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생활고가 피부에 와닿고 있어요. 물론 어떻게 직접적으로 세계경제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채정실(경제 3) : 솔직히 취업난 이야기도 말하자면 돌고 돌아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지요. 미국이 돈이 없어서 내가 취업을 못해 라고 일차원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때문에 저희가 경제를 논하는 기회가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민영(북한 3) :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경제위기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조용민(고미사 4) : 현대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내수가 아니라 수출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혹은 영향력이 큰 미국이 기침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린다고들 하죠? 일단은 세계 경제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영향을 받지 않게끔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일듯 싶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생활고, 취업이 물론 우선인 것 같구요.





채정실(경제 3) : 내수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해요. 하지만 당장 우리나라가 자원을 만들어 낼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강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 삼성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탄탄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듯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없구요. 안그래도 우리나라 공무원 공무원 하면서 안정적인 직업 찾는 판에 우리보고 중소기업을 가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에요.

장민영(북한 3) : 저도 중소기업 연계 대외활동을 해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힘든 기업도, 힘든 대학생도 너무 많다는 것을요. 중소기업은 사람을 원하는데 막상 중소기업의 실태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바라보기엔 너무 열악한 곳이 많아요. 정부의 지원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보조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제가 했던 대외활동도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한 거였는데, 2 회째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단계가 황당했던 것들이 많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학생들에게 기업들에게 시키기만 했지 피드백도 전혀 되지 않았어요. 진짜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송경민(공공행정 4) :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과연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대만에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대만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죠. 외화벌이를 하는 것은 큰 대기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이익을 대기업만 취한다고 생각하세요? 대기업이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게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채정실(경제 3) : 하지만 그런 대기업들은 주로 탈세를 하죠. 그리고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한 나라의 내수가 좋아지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물론 대기업이 잘되면 좋기야 하죠. 하지만 그쪽으로 집중된 이익들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김이환(북한 4) : 저도 지금 이시점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복지를 늘리고 평등을 위하는 정책이 절대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 경제속에서 덜 흔들리려면 스스로 강해져야 하는데 외부에 의존하는 기업만 가지고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민영(북한 3) : 저는 세계경제라는 이렇게 큰 주제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바라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대학생들이 경제위기 못느끼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어요. 이렇게 토론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들어봄으로써 제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바쁜 시험기간에 잠시라도 시간 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의견 많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③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강소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토론할 주제는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인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세요. 유럽의 재정위기와 관련된 페이지는 2 페이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과 월례토론회 자료에서 본 바로는 이중 한 가지 원인은 유로화 때문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단계와 수준이 다른 두 그룹 사이에는 경쟁력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 사이의 경쟁은 원천적으로 불공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차이로 피해를 본 나라 중 대표적 사례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재정긴축과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경지침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은 국가부도 가능성이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한국경제에 대해 토론하자고 하면서 외국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사태만 본다고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하여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실 때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월례토론회자료를 참고하시면서 토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준비해주세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혜: 저도 이번에 직접 월례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학교 수업시간에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어떤 교수님은 유럽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제도 내주셨었어요.

그 때 제가 조사했던 내용은 바로 기업의 허리띠 졸라매기였는데요. 포스코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수출량을 줄이는 등의 비상전략을 시행했다는 것을 조사했어요. 조사하면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유지선: 저도 그렇게 느껴요. 방학 때 유럽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유럽에서 어느 국가를 돌던지 '삼성'이라는 브랜드 광고가 다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면서도 삼성이

대단한 기업이라는 건 알았지만, 막상 해외에 나가서 직접 경험해보니 국제시장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앞서 소라 씨가 말한 유럽 재정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크니까,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아예 기업들의 수출비중을 조금씩 낮추는 것은 어떨까요?

강소라: 지혜 씨와 지선 씨의 의견은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 비중이 낮아져 기업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 한국의 EU 수출 비중이 낮아 직접적 영향은 작을 전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EU 에 대한 수출은 현재도 비중이 낮기 때문에 굳이 더 수출 비중을 낮춰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안효정: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직접적으로 한국의 수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도 중국이나 일본 같은 곳을 통해서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무역부분의 영향력이 작다 하더라도 금융을 통해서는 또 파급효과가 다를 것 같고요.

강소라: 효정 씨 말씀이 맞아요. 실제로 EU 에 대한 비중이 낮아서 직접적 영향은 작더라도 중국과 같은 나라를 통한 간접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여요. 실제 자료를 중국의 수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EU 에요. 그런데 EU 의 재정위기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까지 연쇄적으로 감소할거라고 생각되네요. 보람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보람: 제가 중국에서 살다 와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수출까지 감소한다는 말은 조금 과장된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중국이 EU 수출로 인해 수입이 많이 감소했다고 해도 그것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시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중국까지 나아가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김지혜: 저는 보람 씨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율과 또 유럽의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수출 비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지만 토론회를 보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보람 씨가 말씀하신 것은 토론회자료 11 페이지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010 년에서 2012 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전체수입 증가율 둔화보다 중국의 한국 수입 둔화율 폭이 더 크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소라: 그럼 지금까지로 미뤄봤을 때, 지혜 씨, 지선 씨, 보람 씨, 효정 씨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무역의 파급효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지영 씨는 이러한 무역경로를 통한 파급효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지영: 저도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생각이 조금 달라요. 현재 유럽의 상황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수출이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나라의 수출비중만 줄이자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큰데, 유럽의 재정상황이 더 나빠져서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때를 대비해서 수출비중을 모두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이익이 나지 않겠지만, 미래의 안 좋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직접, 간접 영향을 미치는 곳 모두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소라: 지영 씨는 수출 비중을 모두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선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영: 저는 이럴 때 일수록 수출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k-pop 이 매우 유행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도 인지도가 생기고 있고요. 저는 이 기회를 잡아서 유형물의 수출은 줄이되, 이렇게 무형물로 된 수출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소라: 선영 씨의 생각이 참 새로운 것 같아요. 유형물의 수출을 줄이고 무형물의 수출을 늘리자는 주장이 매우 새로운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유지선: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너무 무역을 딱딱한 것으로만 보고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형물이라고 하니까 든 생각인데 금융도 무형물 아닌가요?

김선영: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금융경로를 통한 파급효과 부분을 보면 한국이 EU 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금융이란 것에 K-POP 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있는 건 아니지만 K-POP 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크다고 생각해요.

강소라: 그럼 선영 씨는 무역에서 수출 부분을 증가시키되, 그 수출하는 것을 K-POP 과 같은 무형물로 하자는 주장이신가요?

김선영: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수출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김지혜: 하지만, K-POP 을 무형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K-POP 이 인기를 얻으면 인기 있는 가수의 앨범, 브로마이드 같은 것도 함께 인기를 얻게 되니까 무형물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영 씨 말대로 무형물이니까 수출을 증가시키자는 것도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안효정: 그런데 지혜 씨, 저는 선영 씨의 주장이 억지는 아니라고 생각 되요. 저는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국가이미지 개선 차원으로 좋은 한국음악을 수출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번 방학 때 프랑스, 노르웨이 친구들을 초대했었어요. 그 친구들이 한국 와서 가장 놀라워해 하던 건 바로 똑같은 건물이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나라 문화를 잘 보존해서 관광요소로 활용하잖아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똑같이 생긴 건물들을 새로 짓기만 하고 옛것은 다 부수고만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국가이미지가 아니라 국가 문화 이미지도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해요. 음식점을 예로 들자면 일본은 일식집만의 분위기가 있어 일본의 문화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너무 음식팔기에만 집중하고 있죠. 저도 선영씨의 주장처럼 무형물인 문화이미지 콘텐츠를 살려 수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소라: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겠습니다. 지영 씨는 직접, 간접 영향을 주는 모든 나라에 대해 수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선영씨와 효정씨는 문화콘텐츠를 수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의 수출만 줄이자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장 하나하나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해외시장과 국내시장만의 문제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는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토론할 때, 언급되었던 삼성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인지도가 높다는 것이요. 한국은 왜 삼성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우리나라가 대기업만을 밀어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대기업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가영: 친 대기업 정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대기업이 국내시장에 기대하는 것은 없고 결국에는 해외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친 대기업 정책은 더 이상 한국의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강소라: 가영 씨 친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소개해주시겠어요?

김가영: 2012 년 상반기에 정책금융공사가 신성장, 녹색성장, 지속가능산업에 지원된 돈이 전체 금액 중 70%에 달한다고 해요. 이에 반해 일반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20% 수준에 머물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안정기금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1 원도 지원되지 않아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는 신문을 보았어요.

이 기사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중소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대기업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을 좀 도와줘서 그들의 경쟁력을 살리고 수출도 하고, 수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은 중소기업 정책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시도한 게 있기나 한가요?

강소라: 가영 씨 동반성장위원회를 모르시는군요. 제가 한국선진화포럼 홍보대사로 동방성장위원회에 다녀와서 위원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가영 씨처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동방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설립이 2010 년에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에요.

유지선: 저도 가영 씨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방학에 유럽에 나갔을 때, 삼성이 일본 브랜드라고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삼성도 자신들이 한국기업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왜 이런 대기업을 도와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삼성이 해외서 돈 버는 건 삼성이라는 기업한테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한국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제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지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별로 경제발전이 안 된다고 그것조차 안하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해외에 가서 번 돈이 그 대기업에게 순수하게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깐요. 하지만 우리나라 너무 대기업을 위한 정책만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이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서 많이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소현실은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박선영: 그런데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만 하고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김지현: 그런데 선영 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왜 대학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할까요?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이 좋지 않으니깐 그렇죠.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근무여건을 좋게 하면 대학생 취업난도 해소되고 얼마나 좋아요.

김보람: 저는 중소기업 지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업계 학교들을 더 특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실업계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실제로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가는 학생들이 존재하는데도 말이죠.

저는 이런 사회 인식도 개선하고 실업계를 더욱더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학생들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직해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도 살아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깐요.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소라: 맞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는 것은 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아니니깐요. 보람 씨의 의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모두 대기업만을 밀어주는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모두들 의견이 같으시네요. 실제로 토론회 자료 26 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를 그래프로 보기 좋게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역, 금융,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의견은 모두가 같았고요. 여러분 그럼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이 가능한 국내총생산성장률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인구증가율, 저축률 등이 포함된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도 하락되고 있는데요.

유럽의 재정위기, 중소기업문제 뿐 아니라도 잠재성장률의 문제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고령화 사회는 총인구 중에 65 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에 이르렀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지영: 제가 사회복지학과에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관심이 많아요. 교수님들께서는 유망한 직업은 사회복지사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한국은 늙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저는 사람들의 이제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야 고령화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일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은 사라지고 남은 건 노인이에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 된다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한국을 발전시킬까요? 저는 정부가 여성들에게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소라: 저도 지영 씨 말에 동감합니다. 여러분 국가적 자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 국가적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예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여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조사를 하면서 저도 인구표 같은 것을 많이 봤어요. 이 문제는 나라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에요.

김지혜: 말로는 정부가 많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두다 정규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으로 보여요. 정규직, 공무원인 여성만 애 낳는 거는 아니잖아요. 왜 비정규직이나 공무원이 아닌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애기를 갖기가 힘들까요.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강소라: 맞아요. 그런데 다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이를 엄마만 키운다는 생각이요. 왜 그럴까요? 아이는 엄마혼자만 낳고 키우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저는 남성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육아휴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파파쿼터제 같은 것이 아주 잘 시행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이 어떻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 같네요. 이제 강의실을 빌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무역, 금융, 대기업과 중소기업, 교육, 인구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모든 의견은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토론회 자료와 제가 따로 준비해드린 자료를 모두 참고해 주시고 토론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④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신문이나 TV 뉴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경제위기'라는 말을 다들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9 월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도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룬 바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선진화연구모임에선 대학생들은 경제위기를 실감하고 있는지, 또한 토론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경제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서영(국어국문 3): 이번 주제는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월례토론회 영상을 보시면 경제위기가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럽재정위기와 무역 둔화, 그리고 실업률, 가계부채 등이 그것입니다. 요즘 매체를 통해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경제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황규정(국어국문 4): 아니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해서 소득을 얻고 주식과 투자를 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공부를 하는 비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다래(국어국문 3): 저도 식료품 가격이나 밥값이 올랐다는 사실 정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박한진(국어국문 4):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생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말 경제위기가 커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네요.

김현경(국어국문 3): 하지만 사실 '밥값이 왜 이렇게 올랐지'라는 생각은 자주 해요. 요즘 들어 특히 더 올라서 경제위기라기보다 물가에 대한 걱정은 항상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김서영(국어국문 3): 그렇다면 대부분 실생활에서는 크게 와 닿지는 않는 것이군요.

정다래(국어국문 3): 물가 상승이나 경제성장 부진 등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매체에서 부풀려 전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자꾸 접하니까 경제위기에 대해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해요.

박한진(국어국문 4): 전문가들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저 또한 과거보다 살기 어려워졌다고는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절반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김현경(국어국문 3): 국민이 직접 느끼는 경제위기는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 나가는 지출이 더 많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김서영(국어국문 3):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은 제자리인 경우에 국민들은 경제위기라고 느낀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월례토론회에서 이번 경제위기는 앞으로의 회복 방향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확실히 최근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간 격차.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것, 대학 인력의 활용 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방안이 있나요?

황규정(국어국문 4): 지금 이야기되는 이러한 해결책은 지금 새롭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거론되었던 것들 아닌가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특정기업 독과점 문제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사회 과목 수업을 들을 때부터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 이것을 해결 대책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왜 아직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박한진(국어국문 4): 저도 동의합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해결책은 이미 거론되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원론적이라고 받아들여졌어요.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는 2000 년대부터 계속 거론되는 문제이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1980 년대처럼 고속성장은 어려운 것이 당연하지요.



정다래(국어국문 3): 저는 토론회에서 이야기된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통폐합'은 대학을 너무 취업을 위한 등용문으로만, 지극히 산업화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존재 의미를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통폐합은 대학을 더 취업을 위한 곳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실무를 가르치는 것은 전문대학의 역할이 되어야 하죠.

김서영(국어국문 3): 다래 학우는 대학이 학문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들은 지식인, 즉 고급인력으로써 활용이 되어야 하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에 진학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다래(국어국문 3): 토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가 어쩌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육아휴직, 결혼 적령기의 변화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토론회에서는 단순히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결국 토론회에서는 복합적인 문제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황규정(국어국문 4):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라는 말에 공감해요.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육아 휴직 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출산율은 낮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노동 인원도 낮아지겠죠. 이는 또 다시 경제 저성장의 원인이 될 것이고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에서부터 끊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서영(국어국문 3):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현경(국어국문 3):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많이 모이는 일, 즉 식당 등 서비스직의 경우 임금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처럼 노동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성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고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한진(국어국문 4): 고용주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면 그러한 복지를 하지 않고도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해야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논리이죠.

황규정(국어국문 4): 바로 그것이 문제에요. 사람을 단순히 노동력으로만 물화시켜서 보는 것 말이에요. 만약 노동자를 단순히 이익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환경은 개선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해지고 있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엔 '가치관의 문제'에요.



김서영(국어국문 3): 결국에는 또다시 복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토론회에서는 복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당장 대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복지의 확대, 경제민주화 등에 집중하느라 자칫 경제위기 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규제완화, 조세부담 경감 등의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규정(국어국문 4): 조세부담의 경감 등은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뜻인데, 문제는 그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업이 투자를 해야 경제 회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데, 기업은 이익이 늘어도 좀처럼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도 국민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물론 조세부담의 경감,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기업은 성장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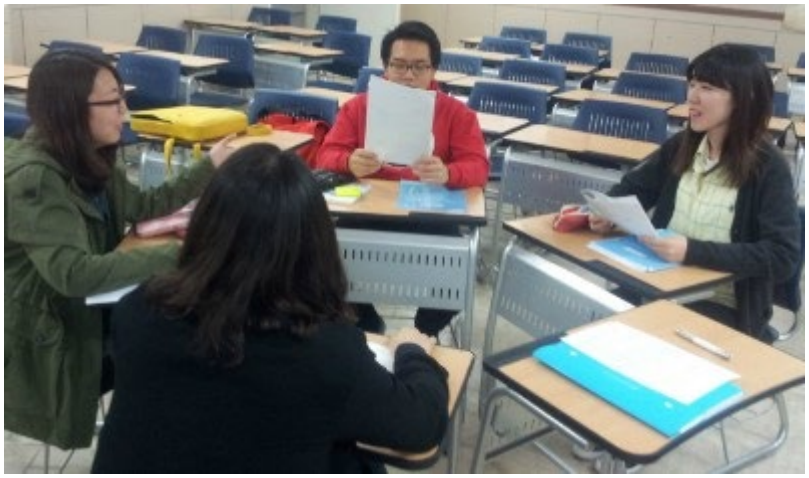
박한진(국어국문 3): 저도 동의합니다. 경제위기만큼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현 정부에 들어서 기업이 발전하고 수치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이원화가 진행되었어요.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 0.312 에서 0.314 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 년에는 0.311 으로 보다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를 푸는 것은 이원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서영(국어국문 3): 그렇다면 규제완화, 조세부담 경감과 같은 방안이 아니더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육성해야 할까요?

박한진(국어국문 4):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내실을 다져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양극화 등의 문제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경제성장과 같은 수치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치가 낮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서영(국어국문 3): 저도 외국의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수출 등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수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산업의 고급화 등이 있겠지요.

정다래(국어국문 3): 서비스 산업을 분류하면 요식업계 등 저부가가치, 보건이나 교육 등 중부가가치, 금융과 보험, 부동산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저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고부가가치인 금융이나 보험 등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면 좀 더 큰 가치를 창출하여 내실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요?



박한진(국어국문 4):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기업 위주의 수출,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죠.

김현경(국어국문 3):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빼앗아가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황규정(국어국문 4):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대기업에만 몰리던 노동력도 분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원하는 복지나 연봉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이 갖춰져야 되겠죠. 이는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청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실력 있는 청년들이 대기업만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인력으로 중소기업은 더욱 성장할 수 있겠지요.

이런 선순환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정경유착'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성장이라는 수치에만 집착한다면 당연히 대기업의 독과점 등 부조리에 눈감아줄 것이고 결국 표면적인 경제위기는 면할지 몰라도 내실은 다질 수 없는 것이지요.

박한진(국어국문 4): 맞아요.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꼼수를 쓰는 재벌이나 횡령을 하는 CEO 등 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허다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황규정(국어국문 4):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이익을 왜 남에게 양보해야 하느냐는 인식보다는 하나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서영(국어국문 3): 맞아요. 매체에서는 경제위기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더 많이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에는 법 집행의 공정성, 정부의 공정성이 뒷받침 되어야겠지요.

박한진(국어국문 4): 중소기업이 가운데서 든든하게 자리잡는다면 적어도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삼성이 위태로우면 우리나라 전체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면 작은 경제위기에도 불안함은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대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갈수록 성장해 나간다면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서영(국어국문 3):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내실을 다짐으로써 위기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결국 경제성장이라는 수치 등의 표면적인 성장은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거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치라는 표면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10 월 12 일 명지대학교 강의실에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68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는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였습니다. 월례토론회에 참석한 후, 연구모임원들에게 주제를 말해주자 다들 어려워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주제가 좀 거대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로 쪼개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진행자: 요즘 청년취업 문제가 요즘 심각합니다. 그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대책은 어떠한가요?

김유나: 공업 고등학교나 상업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진학률을 높여야 합니다. 대학공부보다 취업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가능해져야 지금보다 더 나은 취업률이 보장되지 않을까요?

박대윤: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취직할 자리가 없어서인가 능력이 없어서인가의 문제인 것 같다. 즉 눈높이의 문제라는 것인데, 탄탄한 대기업만 들어가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성향이 취업을 더 어렵게 하는것 같다. 예전엔 취직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요즘엔 해외연수가 기본이 되고 스펙 또한 그렇다. 예전 사회의 상황에 자신을 보았을때 현재 사회의 상황에도 부족하지 않은 능력이라 평가하여 취직에 위기감을 느끼지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김강민: 그런 것 같다.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보니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중소기업이 돈을 덜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현실적이다. 나중을 생각하면 지금 그렇게 살기 위한 취업을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의 제도적 문제와 기업의 구조적 문제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박대윤: 자기의 능력에 맞춘 취업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능력에 맞춘 취직이 맞지만 어느 정도 수준 아래로는 생활이 힘든 취직이 된다고 생각한다.

진행자: 중소기업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어떠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김강민: 정규직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도움이 역시 필요할 것이다.

박대윤: 기업이 통합되거나 인수되는 듯한 대기업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클 수 있는 발판 마련이 되질 않는다.

전다애: 하지만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통합시켜버린다면 그 망할 것 같은 작은 회사들은 오히려 그들의 아래에서 더 클 수가 있지 않을까?

박대윤: 기업과 정부 국민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이 정부의 힘으로만 해결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진행자: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다애: 그렇다면 중소기업에서 사회봉사 등을 하거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교육을 미리 시켜주고 그런 제도를 중소기업 내에서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박대윤: 그렇지만 교육받은 아이들은 더 큰 욕심으로 더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결국엔 큰 기업에 취직하게 되지 않을까?

김유나: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는 중소 기업 하나의 자제척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같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진행자: 창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지만 큰 위험성이 따르기도 합니다. 청년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대윤: 창업을 지원해서 5 년이나 10 년은 인수되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런 제도를 마련해버려서 벤처기업이 더 클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김강민: 법을 만들더라도 결국엔 하자가 있을것 아닐까? 법 마지막에 '하지만-' 이라는 조건이 붙여질 것이다.

박대윤: 정말 좋은 기술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이 흡수되버리면서 그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을 못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행자: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시각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박대윤: 전부 똑같아지는 사람들의 수준에 자신의 수준을 가늠하지 못한다. 2017 년 고등학생의 졸업생 수와 대학교 입학생들의 수가 같아진다고 한다. 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역전 될 상황인데 어떤 것이 취직을 정해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적이나 자격적인 조건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식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기존의 취업 조건들은 이젠 엎어지고 다른 것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추세가 있는.. 그런 새로운 취업의 조건이 필요할 것 같다.

전다애: 난 그런 인식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결국 개선되지 않는 인식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김유나: 중소기업에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중소기업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삼성같은 경우는 마흔 정도만 되도 은퇴를 권유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비슷한 문제가 아닐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다면 중소기업이라 해도 그 안에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터득하도록 일을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병원에서 일할 입장인데, 별로 좋지 않은 병원에 취직을 해서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취업 준비생들의 인식들도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박대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온 나이 많은 지원자보다 더 젊은 사원을 뽑는 이유는 어린 사람이 취직해야 기업 안에서의 위계질서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은 관료제의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책을 꼬집어내기엔 어려운 토론이었지만 대학생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편하게 나눌 수 있었던 토론이었습니다.



⑤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아시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리나라 경제 역시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선진화포럼은 68 차 월례토론회에서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룬 바 있다. 이날 국내 경제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것들 가운데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 숭실대 선진화 연구모임이 토론을 전개했다.

〈토론 전문〉

진행자

유럽발 경제위기가 이제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어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을 비롯하여 몇몇 유럽 국가들은 실업률 및 청년고융률에 있어 악화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글로벌로 확산되어 아시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추진 중인데, 그 중 지난 월례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안 중 하나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이종욱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각한 것은 수업시간에도 많이 듣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어서 잘 알고 있다. 다만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 조그마한 파편이 우리나라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큰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가장 무서운 면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 이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움직임의 방향이나 세부사항 등이 좌우될 것 같다.

금재민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적잖은 파급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경제위기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물론 과거 산업화 시대에 행해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정책을 옹호한다거나 그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경제위기라고 자꾸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경제위기로부터 언제 자유로웠는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여파를 고민할 때 크게 떠들썩한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서민규
금재민 학우의 말에 동의하는 바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성장 발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한다. 그 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해왔기 때문에 저성장이라는 말에 다소 겁을 먹는 것 같다. 또한 저성장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아주 연관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확대해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의 저성장을 야기한다는 그런 논리 말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는 분명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페인과 그리스 문제를 나도 신문을 통해 접했는데, 실업률의 50%가 청년실업이라고 한다. 아까 이종욱 학우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체감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점은 나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심각성은 필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진행자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글로벌 경제위기 간에 실질적인 개연성이 적용되는지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평을 통해 앞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다. 글로벌 경제위기인 만큼 우리나라도 마냥 손을 떼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기업의 계획 등 다양하게 이에 대처하려는 움직임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처음 말했던 대학 구조조정 역시 행해지고 있는데, 먼저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대학과 구조조정이라는 말 간에 관련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금재민
대학은 근본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는 언제인지 모르게 대학은 취업양성소가 되었고, 대입 원서접수는 입시철 장사의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들이 부인하더라도 일정 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고 본다. 대학의 수익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등록금이다. 단과대학별로 상이하게 다르긴 하지만 개인별 연 천만 원 내외의 금액을 학교에 지불하므로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수익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대학에게 있어서 학과 통폐합이나 혹은 부실대학으로 인해 폐교조치를 내리는 부분은 학교 입장에서는 불운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경우엔 대학 입장에서 보면 입학률과 취업률이 낮아 결국 수익성에서 손실을 보는 것이 되므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진행자
금재민 학우의 말을 들어보면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 수가 적어지면 학교 측에서 봤을 때 수익성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학교는 손실을 본다는 것 같다. 그리고 학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통폐합 시키는 것은 수익성 창출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것 같은데, 맞는가?

금재민

그렇다.

진행자
그러면 학교가 손실을 보는 것은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가? 즉, 학생들이 다니고 있던 학과 혹은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럼 학교의 수익성이 아닌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금재민
개인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취업이 되지 않는 학과 출신의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되어 이는 일정부분 구조조정은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서민규
대학은 투입과 산출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학과를 통폐합을 시켜 정원 감소로 이어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인 것이 확실하다. 대학은 시장논리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결과물이 없는 학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진행자
그럼, 죽어가는 학과는 모두 죽게 내둬야 하나?

박지원
듣기로는 문사철이라 하여 문과계열에서 몇몇 학과가 실제로 몇 학교에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가깝게는 동국대가 작년에 독문과, 북한학과 그리고 공대계열 학과의 통폐합 지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요즘 대학이 취업을 위해 거쳐가는 곳이라고 하는 의견이 많다지만, 대학은 대학이다. 배우는 곳이고 취업이 아닌 꿈을 키워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학과 구조조정의 개연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서민규
당연히 죽어가는 학과를 그냥 놔둬선 안 된다. 이런 건 어떨까. 프랑스에서는 파리 1 대학, 2 대학이라고 하여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대학 이름을 건드리자는 게 아니라 취업이 되지 않지만 정통성을 지닌 학과들만 갖춘 전문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종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예를 들어 문사철이라면 그런 쪽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학과만 설치된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다.

진행자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다. 실현여부는 아무래도 사회적 동의와 정책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무턱대고 취업률만 놓고 학교를 구조조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종욱
취업률을 기준으로 학과 통폐합 및 부실대학 선정 등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입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지하철, 버스, 거리 광고판에서 어렵지 않게 대학 홍보를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많이 쓰이는 홍보 방법 중 하나가 “취업률 1 위”인 것 같다. 모든 학교가 다 취업률이 1 위다. 평가기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학교가 다른 선상에서 동일한 취업률 1 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자료 역시 검증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검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여타 자료들을 지나치게 맹신하면 안 되지 않냐는 것이다.

금재민
물론 맞는 말이다.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자료를 무시할 순 없다고 본다. 글로벌 경제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놓고 생각하면, 노동인구가 많으면 좋은 것이고, 더불어 좋은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을수록 우리 경제에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취업률이라는 통계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선순환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행자
거꾸로 생각해보자. 취업이 안 되는 학과는 구조조정 당한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지원이 보장된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면을 우리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학교는 2 년 전 금융학과와 국제법무학과가 신설되었다. 내년엔 국제학부도 신설예정이다. 공통점은 학교의 전폭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지원
학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입장이다. 해당학과 학생들은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생활비는 물론 등록금까지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각종 해외 교환학생 혹은 인턴십 과정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는다.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성장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여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형평성이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같은 숭실대학교 학생인데 누구는 돈을 내고 다니고 누구는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부당함을 낳는다고 본다. 이건 성적 우수장학금 혹은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받는 장학금과는 다른 차원인 것이다.

서민규
솔직히 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타 학과 학생들에게 있어서 역차별을 낳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그 예산을 좀 더 골고루 쓴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만족스러워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종욱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도태시키고,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그 흐름에 부합한, 어떻게 보자면 가장 전도유망한 학과를 개설하는 건 학교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대학은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나도 생각하는데, 그 수익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전 있는 학과를 만들어 학생들을 양성하고 사회에 배출하면 사회에도 좋고, 학교도 좋은 윈윈(win-win)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이런 논리가 안타까운 건 사실이다. 나도 예전에는 대학에 공부하러 왔다. 그러나 제대를 하고 사회에 나가야 할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점점 대학에 왔던 그 목적, 처음 마음과 달라지는 나를 보게 된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진행자
예전에 한 교수님이 “대학의 존재 목적은 진리탐구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난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거나 웃음을 터뜨린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즉 “옳은 걸 보고 옳다고 했을 때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우리 사회에 잘못 인식된 대학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대학에 낭만이 사라졌다는 말도 들을 수 있다. 이제는 급기야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화된 대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안은 없을까.

금재민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다. 자원이라고는 인력이 전부다. 또 그 인력이라는 자원이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은 인력을 발전시키는 훌륭한 곳이다.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앞서 말한 교수님의 경우엔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라고 하셨다는데, 꼭 진리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를 한 자원이 인력이고, 그 인력의 발전 원동력은 대학에 있다면 “취업”이라는 말을 유화시켜서 표현했다거나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서민규
대학을 구조조정을 하는 전제에는 산업수요에 맞춰서라고 돼 있다. (KDI 원장 PPT 자료) 산업수요를 고민해보면 취업이 안 되는 학과 이를 테면 문사철 등과 같은 학과에 대한 사회적 산업수요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한 전문직이 아니고선 문학, 역사, 철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맞닥뜨리는 첫 인상은 황무지와 같다고 한다. 내가 봤을 땐 그들을 위한 산업 시스템이 좀 더 발전되고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취업률에 있어서 그쪽 계열은 계속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결국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종욱
언급된 학과들을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직업에 종사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런 선택은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또한 철학, 역사와 같은 학과는 통폐합을 통해 전체적인 배움의 수요를 줄여선 안 된다고 본다. 그들만의 전통성이 있다. 그런 것을 살려서 원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행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또 더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하나인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 산업수요에 맞춰 구조조정이 필요한 현실에 당착했다. 그러나 학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취업률을 비롯한 통계자료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이 취업 양성소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보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오늘 함께 자리해줘서 고맙다.

숭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를 두고 공방전은 아니지만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다. 특별히 산업수요에 맞춘 구조조정은 효율성을 갖출 것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생각하여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산업수요가 부족한 면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높은 취업률을 위해 신설하는 학과의 경우 학교와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인재 양성 및 취업률 향상이라는 부분에서 기여하지만, 대학 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대학의 변혁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일지는 여전히 고민해봐야겠다.

⑥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10 월 04 일 목요일, 제 2 차 경북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모임에선 68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요.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경제위기와 그 대처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경영 2): 자, 시작할게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발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영향을 받아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제성장률 또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렇다면 점차 확대되는 경제위기,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 각자의 생활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권수정(경제통상 4): 네, 저는 조금 실감하는 것 같아요.

김정원(경영 2):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권수정(경제통상 4): 일단,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시장을 애용하는데 대체적으로 공산품이나 다른 품목들 모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박경선(간호 3): 아이스크림 값이 2 천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천원 넘는 제품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올라 편하게 사먹기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김시영(경영 2): 물가보다 중요한 건, 용돈이 안 올랐다는 점입니다. 용돈은 제가 군대 가기 전과 같은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거 같아요.

이민지(영어교육 2): 그 이유는 아버지의 월급이 그대로이기 때문이겠죠.

김시영(경영 2): 저희 학교 동문 쪽 식당이나 학생식당이 예전에 비해서 천원이나 더 올랐는데 저희 용돈이 인상이 안 되니까 더 힘들죠.

서혜인(경영 4): 물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경제원리 때문인데, 경제위기 때문에 월급인상이 더디게 되니까 물가인상이 월급인상보다 더 많이 된 것이잖아요. 결론은 월급이 안 올라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정원(경영 2): 그렇다면 세계 전반적인 평가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감하시나요?

권수정(경제통상 4):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저희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영을 잘 꾸려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이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최근 국가 부채가 증가해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석(전자공학 4):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외적 활동보다 내실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G20 과 같은 대외적 성과는 늘어난 것 같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다시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혜빈(응용생명과학 4): 기업은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지금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으니까 살림살이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김정원(경영 2):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소외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박경선(간호 3): 지금 저희는 다시 쓰러지지 않기 위해 허리띠를 엄청 졸라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영국에 2 달 동안 체류한 적이 있는데, 한국과 비교해봤을 때 공산품 가격이 엄청 쌌습니다. 독일은 더 저렴했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밀 등 농산물 생산량이 저희와 큰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산품 판매로 너무 많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민지(영어교육 2): 서민들은 보통 공산품 가격이 거의 생활비라고 보면 되는데, 공산품 가격 자체가 점점 더 비싸지니까 생활비도 점점 부담이 되는거죠.

서혜인(경영 4): 물론, 기업의 이윤추구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공산품 가격은 사회 환원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해서 이윤을 조금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호윤(경영 2): 저는 지금 정부가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계부채도 현재 GDP 와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 부채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으니까 제 2 금융권이나 사채에서 대출받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뚜렷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선(간호 3): 그리고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사람이 빌리는 천만 원과 고소득층이 빌리는 천만 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느끼는 돈의 가치가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는 조금만 큰 금액을 빌려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거죠.



김정원(경영 2): 그렇다면 지금 경제위기가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희 학교를 위주로 말해본다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서혜인(경영 4): 아무래도 가장 고심하고 있는 취업에 문제가 되겠죠.

이민지(영어교육 2): 경제위기 때문에 고용에 돈을 투자를 안 해서 일자리 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김시영(경영 2): 그런데 중소기업 쪽에서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서혜인(경영 4): 그런데 우리가 취업준비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복지수준 이라든지 임금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중소기업 쪽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도 요즘 평생직장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직해서 임금인상을 많이 기대하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가게 되면 이직을 좋은 곳으로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이직을 원하면 이직시장에서 유리한데 중소기업을 가면 그렇지 못하니까…

서혜빈(응용생명과학 4): 사람들의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면 인정해주는데 중소기업에 다니면 능력이 있고 자기가 원해서 들어갔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박경선(간호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심한가요?

이민지(영어교육 2): 대기업 평균초봉연봉이 3000 만원 정도인데 중소기업은 2000 만원에서 3000 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전자공학 4): 문제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대기업신입사원과의 임금격차를 줄일 만한 방도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직시장을 가게 되더라도 연봉협상을 할 때 그 전 연봉에서 +,-를 하게 됩니다. 이직시장을 가더라도 대기업 사원과 차이나는거죠.

서혜인(경영 4): 업무의 양만 따지면 거기서 거기인데 임금과 복지가 차이 나니까 결국은 대기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원(경영 2):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자리 수가 점점 줄어들 텐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을까요?

박경선(간호 3): 저는 서울역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분리수거를 하시잖아요. 그것 보면 젊은 알바생들 쓰는 것보다 실버세대를 그쪽으로 쓰고 더 힘든 일에 인원을 분산시키면 오히려 일자리 수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원(경영 2): 그러면 경제위기가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혜빈(응용생명과학 4): 그런데 지금 대선후보들의 공략을 보면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나 경제성장에 대한 공략은 없는 것 같아요.

김시영(경영 2):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복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책으로 0~2 세까지 보편적 복지를 실행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데 세 후보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권수정(경제통상 4): 저는 솔직히 반값등록금이나 소득분위 70%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소득분위만 따지더라도 69%는 혜택을 못받고 70%는 받고 하는 선별에도 문제가 있고, 반값등록금도 예산에서 충당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혜택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기엔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혜빈(응용생명과학 4): 국가 장학금만 봐도 지금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은 경우도 많고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을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원(경영 2): 저는 이번 대선 공략들이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가 물론, 시대정신이고 이루어야 할 목표이지만 지금 너무 급하게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네요. 우리가 지금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을 이 시기에는 복지를 조금 늦추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⑦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민숙희(영어 3): 안녕하세요. 제 68 차 월례토론회 '다가오는 경제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2010 년 우리나라 청년실업자 수는 34 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각자 청년 실업에 대해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신용원(외교 4): 일단 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모든 공부와 봉사활동 그 외 하는 일들이 스펙에 목적을 맞추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스펙이 좋다고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김샛별(외교 2): 맞아요. 토익만 해도 외국에서는 토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이 토익 점수가 없으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김해림(외교 1): 요즘 대학생들이 스펙을 너무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스펙을 가지고는 자신의 평생 직업을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서에 적힌 한 몇 줄의 스펙으로 취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 또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슬희(외교 1): 토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토익 자체가 스펙 위주의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나 자기 계발 같은 것을 해나간다면 청년 실업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지연(외교 2):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디가든 꿀리지 않도록 무조건 많은 스펙을 쌓는 것 같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커리어를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보은(외교 1): 저도 동의해요. 여기 저기 스펙 스펙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능력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대학 전공을 깊게 공부하지 못하는 이유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과를 선택해서 대학에 왔는데 스펙 이전에 진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창일(외교 1): 학생들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취업하기 위해서 이직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 안타깝습니다.



김현정(외교 2): 대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도 정부가 주더라도 졸업 2 년 후 취업하면 갚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하면 빚이 점점 늘어나는데 나도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그 빚을 청산해야 내 생활이 괜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숙희(영어 3): 의견 고맙습니다. 저도 졸업이 다가오는 만큼 여러 가지 보여주기를 위한 스펙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적인 스펙 쌓기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실업에 관한 문제는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 또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슬희(외교 1): 일단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통해 학생들의 개발을 도와서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정책이 더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창일(외교 1): 특성화 고등학교랑 취업률이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겉치레인 것 같아요. 주위를 보면 졸업을 해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국가의 확실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성경(외교 2): 여러 정책의 문제도 있겠지만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학생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학을 나왔다고 무조건 대기업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김현정(외교 2): 동의해요.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너무 대기업에 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성공으로 받아들여 지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실업률과도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고 흥미 있는 분야에서 귀천을 따지지 않고 가서 자신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샛별(외교 2): 그건 맞아요.. 저희 교수님도 항상 국내에서만 찾지 말고 해외로도 눈을 넓히면 길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신용원(외교 4):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까 기업 측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해림(외교 1):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위해 취업률을 높이고 있는데 신입을 뽑는 게 아니라 경력을 뽑고 있어요! 기업이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이보은(외교 1): 스펙 경쟁의 원인은 옳지 못한 교육 시스템에서 온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다르니까 잘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일(외교 1):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정책을 내놓았는데 정작 진짜 적극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국가적 도움이 없어서 아쉽고 사회적 분위기가 청년들이 커나가면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폐쇠적인 것 같아요.

구슬희(외교 1): 정부 지원의 청년취업에 대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취업교육이 너무 부실하고요.. 저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취업캠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은(외교 1): 전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이 2 차 세계 대전 이후로 최대라고 합니다. 4 년에서 10 년까지 바라보면서 모든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한 전공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민숙희(영어 3): 감사합니다. 저도 결국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너무 스펙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⑧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10 월 8 일 월요일 늦은 6 시 30 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에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 68 차 월례토론회 주제였던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참여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멤버들은 경제가 다소 어려운 주제임에도 여러 자료를 준비해 와서 열심히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유주원(영문) : 2 차 선진화 연구모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선진화포럼 제 68 차 월례 토론회에서 다룬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어 볼텐데요. 먼저 이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경제 위기를 실감하시나요?

서연수(사회과학) : 사실 저희는 학생 입장이고, 사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 있는 분들보다는 경제 위기를 덜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경제 위기를 느끼는 부분은 관심이 많이 있기도 한 취업률일 텐데요. 갈수록 낮아지는 취업률 통계를 보면 확실히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느끼죠.

임성은(영어교육) : 맞아요. 낮은 취업률도 그렇고 사실 신문 기사나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사실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예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 심각성을 느끼죠. 영세 상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백화점과 같은 대형 기업들도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어마어마한 가계부채, 주식폭락 등 경제위기가 정말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주원(영문) : 네, 그렇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경제 환경 역시 악화되었는데요. 인도는 7 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고, 중국의 수출 수준도 악화되고, 부채 위기에 직면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고 한계에 부딪치는 등 세계적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정경민(스크랜튼) : 일단 우리나라는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다시 말해서 수출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극히 소수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에요. 물론, 모든 품목을 조사하면 그 개수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품목들은 그리 다양하게 발달하지 못했다는거죠. 또 수출하는 물품들도 그 소재와 부품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죠.

유주원(영문) : 그렇죠.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내수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 고용 유발 효과도 적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되겠네요. 실제로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이 침체되면서 더욱 악화되는 경향도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내수 판매 부진과 더불어 수출마저 크게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어요.

서연수(사회과학) : 가계부채도 큰 문제라 생각해요. 워싱턴포스트도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수준에 대해 '위험수준'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나라는 일본, 중국 등 주변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가정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는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결국 사회 전반적인 금융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정경민(스크랜튼) : 사회 양극화도 문제인 것 같아요. 소득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런 소득 분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또 실업 문제도 사실 진짜 커요. 특히 우리가 느끼기엔 실업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아무래도 이 문제죠.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만 지고 있잖아요. 실망 실업자도 늘어만 가고.

유주원(영문) :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가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업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유민경(사회과학) : 실업… 정말 큰 문제죠. 우리도 지금 솔직히 막막하잖아요. 밝은 미래를 꿈꾸고 준비해도 모자랄 시기인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 씁쓸하기도 해요.

유주원(영문)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청년 실업이 큰 문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이런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데는 교육의 취업지원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요. 나눠드린 토론 자료에서도 보이듯이 대졸자 중 NEET(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성은(영어교육) : 취업 교육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입시에 치중된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깊게 학문을 공부하게 되는 것은 대학교 때부터인데 사실 대학교에서 실질적 취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유주원(영문) : 사실 직업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번 토론 때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인데요. 실질적 취업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교를 취업 교육에 중점을 두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경민(스크랜튼) :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만 가르친다는 뜻인가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불필요하게 과다 공급이 일어나고 있지요. 하지만 대학교의 교육 과정 자체를 완전히 취업만을 목적으로 해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문과 쪽에서는 경영 경제 등의 실용학문 분야만 발전시키고 순수학문은 무시하게 될텐데요. 진정한 대학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주원(영문) : 진정한 대학 교육의 목적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경민(스크랜튼) : 보다 깊은 학문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지요.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대학이라고 생각해요. '학교'마저 시장 경제의 원리에 치중하고 실용성만을 중시하다 보면 학문의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요.

유민경(사회과학) : 실제로도 대기업과 같이 경제력을 가진 회사가 대학을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대학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순수학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 생각해요. 순수학문이 바탕이 되지 않은 실용 지식은 뿌리가 얕아 한계에 부딪치게 되지 않을까요? 시장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문학 등 순수학문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장수하는 많은 세계적 대기업들의 특징은 인문학의 가치를 보다 앞서 발견했다는 것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구글은 지난해 대다수 신입 사원을 인문학 전공자들로 채용했다고 해요.

서연수(사회과학) : 국내 대기업인 삼성도 디자인, 기술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중심 역할을 하는 분야에는 인문학 전공자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순수학문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취업난이 바로 눈앞에 놓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용 학문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대입 때도 보면 경영, 경제 등의 학과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 순수학문에 사람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순수학문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주원(영문) : 다들 순수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대학의 진정한 목적은 학생들이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지, 취업만을 준비시키는 곳은 아니라는 의견인 듯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깊은 사고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순수학문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에 대학 관심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취업 문제로 돌아와서,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취업난이라 하며 힘든 소리를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경민(스크랜튼) : 중소 기업을 육성하고, 젊은이들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말만 들으면 옳은 소리이지만 정작 자신의 상황이 되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선뜻 선택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유주원(영문) : 아무래도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의 여건 차이 때문이겠죠?

유민경(사회과학) : 그렇죠. 현실적으로 급여도 너무 차이 나고, 회사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시설 등 다양한 혜택도 엄청나게 벌어져 있으니까요. 자꾸만 대기업이랑 비교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특히나 대학 교육까지 마치면 나름대로 다들 고학력자라 생각하는데..

임성은(영어교육) : 그런 차이들은 중소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요.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해요. 재정적 지원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재정적 지원에서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지원들이요. 이를테면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중소 기업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하는 식의 혜택 말이죠.

서연수(사회과학) :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급여, 환경 차이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격차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얼마 전에 직업 박람회를 ECC 에서 꽤 크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때도 대기업들 위주였던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 관심이 몰려 있다 보니 그런 점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해 보여요. 분명히 특색을 살려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도 존재 할텐데 말이예요. 중소기업 스스로도 노력하고, 아까 정부 얘기도 나왔는데 정부가 효과적 홍보 활동도 지원해주면 더 좋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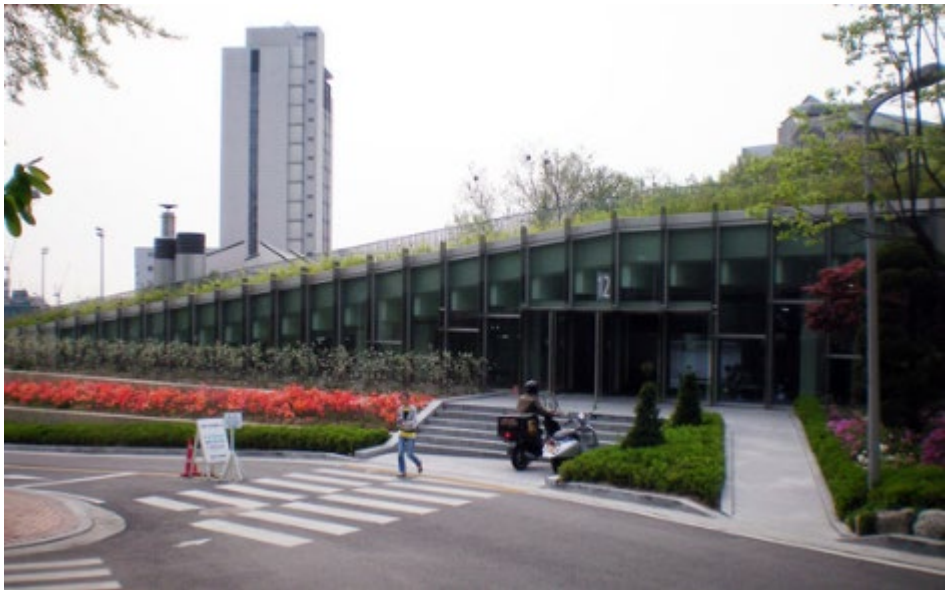
유주원(영문) :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너무나 벌어진 격차를 줄이고, 중소 기업을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활발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경민(스크랜튼) : 대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경력 사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어떨까요? 대기업에 처음으로 지원한 지원자보다 다른 곳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면, 경험을 쌓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대기업 입장에서도 경험이 많고 보다 숙련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니 좋을 듯해요.

유주원(영문) :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경제 위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어봤는데요. 특히 우리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교육과 기업 면에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중에 시간 내서 토론에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10 월 2 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로비에서는 '한국 사회의 경제위기와 그 대처방법'이라는 주제를 두고 선진화 연구모임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 주제는 한국선진화포럼 68 차 월례토론회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토대로 정했는데요. 경제 분야 전공자가 아닌 이화여대 연구모임 참여 학생들에겐 꽤 어려운 주제였지만, 경제정책 측면, 교육적 측면, 그리고 출산율에 대한 측면으로 나누어서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송민영 (국제 2): 안녕하세요. 10 월 선진화 연구모임의 주최와 진행을 맡은 송민영입니다. 이번 달의 토론 주제는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위기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경제위기라고 하면 흔히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나 수치 등 지표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위기와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경제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정 (국제 2): 1980 년대에 한국이 극적으로 발전할 시기에는 지표상, 그리고 서민의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가 모두 호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서민의 생활도 어느 정도 윤택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소은(인문 2): 저도 동의합니다. 이때 수출로 인한 흑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해외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게 돼 한국 경제가 호황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외화가 많이 유입되면서 국내 경제에서 돈의 흐름이 더 활발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송민영(국제 2):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보통 경제에 대한 이야기할 때, 과거의 경제가 참 좋았었다고 회상하는 식으로 경제호황을 얘기하지 현재 경제가 호황이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은 드문 것 같습니다. 이는 서민의 피부로 느끼는 경제의 상황과 전문가들이 지표로 나타내는 경제의 상황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현재 잠재성장률이 catch-up 단계에서 벗어나 줄어드는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온 우리들의 잠재성장률이 왜 줄어드는 것으로 보십니까?



도문정(국제 2): 경제가 발전할수록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국제학부 경제강의에서 배웠던 MPL(Theory of Diminishing Marginal Productivity)(한계생산력이론)의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유안(국제 2): 아직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개발도상국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지만 이미 저희는 그런 단계를 거쳤으니 잠재성장률의 측면에서 그런 개발도상국에 밀리는 것이 아닐까요?

송민영(국제 2):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또한 서비스 직종에서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 증가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희 토론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 위주로 맞춰진 한국의 성장계획 또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답일까요?

박소연(국제 2): 중소기업에만 치중을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정부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많은데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영(국제 2): 월례토론회에서 나누어준 자료만 보아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차이가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임금에서도 차이가 나는 데 정부에서 혜택도 크게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과연 누가 가겠다고 할까요?

김소은(인문 2):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조금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일지라도 지원을 하여 한국의 성장에 한계가 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이 상태로 가다가 보면 기업들 사이에 갭이 너무 커질 뿐만 아니라 후에는 대기업에서 더 이상 성장을 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송민영(국제 2): 지금 약간의 저성장의 위험을 안더라도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여 미래의 성장을 위한 더 큰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례토론회에서 대학을 취업성과주의제로 운영을 하여 기업과 같은 형식의 운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소은(인문 2): 중앙대가 두산의 지원을 받기 시작함으로써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문대학을 천대하고, 경영학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학과가 회계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문대의 통폐합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 인류의 정신적 성숙과 발전에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해 온 것인데, 그 존재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교육하기를 꺼려한다면 인문학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문정(국제 2): 저는 인문대학을 통째로 통합하고 후에는 아예 없앨 예정이라는 대학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유안(국제 2): 과거부터 이러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제기해야 할 의문은 과연 대학이 취업을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장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경제위기라고 하지만 경희대의 특정 교수님의 주도로 인문학의 부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취업과 연결된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돈을 버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가치들을 대학에서 키워주지 않는다면 삶의 목적, 인간의 인간됨을 상실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만큼 인문학의 중요성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도문정(국제 2): 경제의 부흥을 위해 대기업 위주의 구도를 타파하고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진국의 기술 차용을 통한 경제 번영만을 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 장기적으로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특히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인문학 교육에 눈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문학을 만약 통폐합시켜버리고 그 대신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지원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경제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창의성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소연(국제 2): 사회의 대학에 대한 시선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우선순위로 놓고 서열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취업만이 대학의 목적이 아닌데 이러한 실태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김소은(인문 2): 한국에서는 왜 스티브 잡스가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를 본 기억이 나네요. 그 때 나왔던 말이 한국에는 창의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사회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인간만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송민영(국제 2): 대학 내에서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지원하는 것도 모두 좋지만 먼저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새는 좋은 학교나 취업이 잘 된다는 좋은 학과를 나와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과연 대학의 구조에 먼저 손대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소은(인문 2): 저도 일자리를 먼저 늘리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의도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살인 사건 또한 일자리 문제가 한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난이 심각한데요.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원래 2 년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비정규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1 년 10 개월, 1 년 11 개월과 같이 2 년 미만의 기간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도 이러한 불안 속에서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어 살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민영(국제 2): 그렇다면 경제 안정을 위해 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해도 손을 쉽게 쓸 수 없다는 것이네요?

김소은(인문 2): 제가 지난 학기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아보러 다닐 때도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그 때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시간당 4300 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의점에서는 3300 원을 시급으로 제시하며 일하려면 하고 싫으면 말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만약 일자리가 급한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악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최저임금에도 달하지 않는 임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에도 부적합한 구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하기 위해 한 달을 그 편의점에서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는 했지만 더 일자리가 급한 사람이었더라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것입니다.



송민영(국제 2): 정말 제 주변에서도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뻔한 사람이 있었군요. 규제를 해도 규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구증가율을 감소와 경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유안(국제 2): 인구증가율이 줄고 노년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는 단순히 정책을 바꾸어서 분배를 잘 하는 차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일본에서 노년인구에 비해 일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적어서 경제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도문정(국제 2): 저도 복지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아질수록 경제 성장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창출되는 부를 잘 분배하여 복지정책을 잘 확립한다고 해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원을 써서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여 경제의 성장을 이룩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제가 외국에서 투어를 할 때 투어 가이드께서 그 동네 오래 살고 계셨던 할아버지였던 것을 생각하면 실버인구를 잘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유안(국제 2):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출산시 주는 혜택과 같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영(국제 2): 여기서 중요한 구분점은 경제 위기라는 것이 발전을 하지 않는 경제로 정의되느냐,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정의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발전하지 않는 경제가 위기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만약 발전을 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을 하더라도 서민이 느끼는 경제상황이 안정될 수 있게 한다면 경제의 호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정리해 보자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업 위주의 정책보다 향후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소기업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인문학의 장려를 통하여 창의성을 키우고 이것이 미래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저출산율과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실버인구를 잘 활용해야 하고 산모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⑨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지난 10 월 10 일 원광대학교 학생들은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주제 속에서 소주제인 청년실업의 취업률과 중소기업 취업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경제위기에서도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청년들의 실업입니다. 청년들의 실업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경제위기를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 원광대 학생들의 토론을 보시겠습니다.

유선미(신문방송 3):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주제는 청년실업의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를 어떻게 극복해 경제위기를 대처할 것 인가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취업률이 왜 낮아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장보균(신문방송 3): 요즘 들어 청년취업률이 조금은 상승세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하락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조사했을 때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대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는 많은데 청년들의 눈높이는 대기업이다 보니 중소기업에는 자리가 많이 남는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기업만을 목표로 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예슬(신문방송 3): 네, 고학력화로 취업자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창희(국교 4):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대학생 희망 연봉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응답자의 85%가 2500 만원 이상의 연봉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47%가 2000~2500 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안 맞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3700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아람(신문방송 4):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 현상, 부족한 인식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낮은 연봉, 불안전성,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유선미(신문방송 4):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관련되어서 청년실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외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최지혜(신문방송 3):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이라고 해서 자녀 대학 등록금 등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사람들의 생활 지적 수준은 높아지는데, 막상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고 해야 하나요?,

박예슬(신문방송 3): 그런데 저는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해결방안도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청년실업의 원인이 우리사회에 대한 직업의 귀천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부청장님의 칼럼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원인분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려는 곳과 비어있는 곳이 다르다 보니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치, 기술숙련도 차이가 큰 숙련의 미스매치' 여기서 기술 숙련도의 차이는 대학에서 배우는 교과과정과 현장에서 직접 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자는 일하기 좋은 회사를 찾지 못하고, 기업은 회사에 맞는 인재를 찾지 못하는 서로간의 정보가 교환되지 않은 정보의 미스매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창희(국교 4): 임금의 문제나, 복리후생의 문제를 떠나서, 최근 20 대들의 인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들 88 만원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20 대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 88 만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 나면 이것보다도 더 안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벌려는 20 대가 있는 반면에 니트족 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기도 거부하고, 일하기도 거부하여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는 20 대와 먹고 놀려는 니트족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 사람들을 계속 부양하는 사람들은 취직을 한 사람 즉 세금을 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조금 더 도전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지혜(신문방송 3): 그 전에 앞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려는 정부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선미(신방방송 3): 네 지금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점을 임금의 문제, 복지의 문제, 눈높이에 대한 문제라고 보셨습니다. 그 중 청년실업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실업률은 낮추고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순영씨 말씀해주세요.

차순영(군사학 3): 지목을 당해서 말하려고 하니 뭔가 생각이 정리가 안되는데….

이미성(정치외교 3): 생각 정리 안되셨다면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생각해 온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업에 들어가면 자기 계발할 지원금, 상여금 제도가 중소기업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원이 자기계발이 되었을시 분명 회사도 이득을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계발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차순영(군사학부 3): 그리고 중소기업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조금 더 안전성 있는 기업을 추구하다 보니깐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소기업도 구직자들을 구할 때 우리기업에 안전성 등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입사 전 자기를 어필하듯이 중소기업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창희(국어교육 4): 아까부터 국가의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이냐 면, 제조업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 석 박사학위 소지자, 대기업 퇴직자, 기술사 자격증소지자 등 기술적으로 풍부한 인재들을 고용할 경우에 최대 3 명까지 1 인당 최대 100 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 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3 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능력자들이기 때문에 대기업 경력직 못지 않은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계속해서 해야 하지만, 지원금은 1 년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고학력의 인재를 구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인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미(신문방송 3):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이 우선적을 시급한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훈(소방행정 3): 외국의 사례를 들어 몇 가지를 찾아보았는데,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청년실업률과 중소기업 취업률을 비례하다록 정부가 잘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기업, 대학, 정부가 협력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마련시키려고 하고, 기업은 접근성을 높여 공동연구계발을 합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을통해 기업에 필요한 세부 인력들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 기관을 잘 협력 시킨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법학과 3): 그런데 두 나라들은 저희 나라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고 그만큼 빵빵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시계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입장에서 자식을 시계만 배우는 학교에 보내고 싶진 않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주대학교와 대우자동차, 성균관대학교와 삼성전자, 각 의과대학들은 병원들, 사범대학들은 부속 중, 고등학교도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준우(군사학 3): 혹시 플러스파운틴이라는 회사를 알고 계신가요? 그곳은 직원이 50 명밖에 되지 않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분수대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수엑스포의 해상분수를 이 회사가 만들었는데요 이외에도 전국 시도에 이 회사가 만든 분수대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수대 업계 1 위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1 년에 한번씩 직원들에게 해외 여행을 보내주고, 3 달에 한번 체력단련 비, 자기계발의 기회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망한 기업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은 대기업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중소기업은 아주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식 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경제도 살고 모두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미(신문방송 3): 네 지금까지 토론 모두 수고하셨구요. 다음 선진화 연구모임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2008 년 미국 금융위기부터 2011 년 유럽 재정위기까지, 세계 경제는 위기의 그림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경제위기를 피해가지 못하고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10 월 11 일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은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제위기와 그 대처법에 대해 토론해보았습니다.

윤보라: 안녕하세요.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대화할 주제는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동영상자료를 통해 경제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경제위기와 그들이 생각하는 대처방안을 살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할 내용은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느낀 경제위기와 그 대처법입니다. 일단 모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12 년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세영: 우선 2012 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의 불황, 유럽발 경제위기와 같은 세계적 불황을 한국도 피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다가올 2013 년도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경: 저 역시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세영이가 말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내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하에 있다고 봅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7 분기째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중국 역시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는 걸 보면 내년에도 불황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지원: 위기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1997 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치명적인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통해 세계신용평가사인 피치, 무디스, S&P 가 일제히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비록 대출을 해줘도 되는 국가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평가이지만, 신용등급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윤보라: 모든 분들이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을 대표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경우에 경제위기를 실감하시나요?

오세영: 취업난이죠. 청년실업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이 2004 년쯤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저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청년실업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없었지만, 졸업 후 취업난의 당사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기업 공채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보면서 위기를 느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 운영에도 위기가 발생했고, 기업들은 자연스레 인원 감축에 들어가고, 인원 감축은 곧 공채 축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수요는 줄어드는데 졸업자라는 공급은 늘어만 가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점점 더 취직이 어려워지는 사회를 보며 경제가 위기임을 실감합니다.



김현경: 저 역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위기를 실감합니다. 요즘 나오는 채용공고를 보면 정규직을 뽑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짧으면 3 개월에서 길면 2 년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추후 전환이라는 조건부 채용을 제시하는 곳이 많아요.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임금도 적게 줄 수 있고, 복지혜택으로 지출되는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겠지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경우 2 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난 뒤에야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지원: 취업난이 어려운 것으로 경제위기를 실감하기도 하지만 저는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보며 위기를 실감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려해도 1000 원이 넘는 곳이 대부분이며, 어릴 적 500 원이면 사먹었던 과자도 이제는 대부분이 1000 원을 넘습니다. 학교식당의 백반 값도 2 년 전까지만 해도 2500 원이었는데, 지금은 300 원이 오른 2800 원이죠. 어느 한 곳 빠짐없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 우리의 용돈 상승률이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부모님 월급이 제자리이다 보니 그런 것이겠죠. 월급은 동결상태인데 물가는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을 보며 가계에 위기가 왔음을 느낍니다.

윤보라: 맞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취업이 어려운 사회는 경제위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호경기 시절과 불경기 시절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인력 채용이 줄어듦을 알 수 있는데요. 오세영 학생과 김현경 학생은 채용을 하지 않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일간지가 조사해보니 중소기업의 60.5%,

중견기업의 45.9%가 하반기 채용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두 학생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겠죠.

김현경: 네.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60.5%), 중견기업의 절반 가까이(45.9%)가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대기업의 경우 23.7%가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기업의 숫자는 2011 년에 비해 8.9%줄어든 숫자입니다. 기업 운영난을 극복하고자 채용 인원을 줄이기로 한 것이죠.



윤보라: 그렇군요. 여러분의 말을 정리해보면 대학생들은 신입사원 미채용 기업이 늘고, 채용인원을 감소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과 용돈은 제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물가를 보며 경제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차원의 극복방안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방금 전 김현경 학생의 발언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12 년 하반기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곳이 절반 정도 됩니다. 반면 대기업은 1/4 에 못 미치는 23.7%만이 하반기 미채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곧 위기의 그림자가 모든 기업을 덮친 것은 분명하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 간 채용의 양극화는 곧 기업 상황의 양극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위기극복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세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토론회 발제를 맡으신 현오석 원장님도 지적해주신 사안입니다.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흐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의 경제구조가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투자대비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주도를 통해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지원: 중소기업에 비교했을 때 대기업이 투자대비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대기업 주도의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면 잠깐의 경제 상황은 좋아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영상을 보면서 대기업을 다니는 인력과 중소기업을 다니는 인력의 임금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임금차이가 커진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구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 정도로 인식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이 많거든요.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낳는 이익이 크다고 해서 한 곳으로만 몰아준다면 나중에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더 큰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김현경: 동반성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의 말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하청관계에서 파트너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요. 글로벌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또 대기업이 언제 어떻게 무너지게 될 지도 모르죠. 당장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해서 대기업에만 올인한다면 그 리스크도 클 것입니다.

오세영: 대화를 하다 느낀 것인데,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중소기업에 취직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왕이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지원: 맞아요. 기업 간 기술력을 공유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코치 역할을 해준다면 중소기업을 향한 구직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높아진 신뢰도와 기업 경쟁력은 자연스레 '취직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경: 사실 지금은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잖아요.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정이 나아진다면 기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고, 채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질테니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보라: 말하자면, 중소기업이 한국경제 그리고 취업시장의 스페어타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군요. 저 역시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미래경제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아진다면 향후 직면할 위기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나 중소기업은 지금 취업하려는 사람이 없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타파하기 위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핵심역량 차별화를 더욱 강화하고,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과정을 산학협력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학은 취업률에 따라 학과를 통폐합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경: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이야말로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간호대학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이론교육과 함께 병원실습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있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죠.

오세영: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산학협력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전문대가 아닌 일반대학까지 산업수요에 맞춰 대학을 개편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핵심역량은 다릅니다. 전문대학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고, 일반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통폐합 한다는 것은 전문대 일반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학을 취업 양성소쯤으로 인식하는 거죠. 당장 취업에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는 학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공계와 인문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지원: 동의합니다. 일반대학의 학과를 취업률에 따라 통폐합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결과물을 취업으로만 보는 단기적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이 완전히 불필요한 것이라 말할 순 없습니다. 허울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없거나, 타 학과와 별 다른 차이를 갖지 못하는 대학은 구조조정 되고, 산업 수요에 맞는 학과를 개설하는 것도 대학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윤보라: 우리 학교의 경우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2008 년 법학과를 법대로 분류하고 자율전공학과를 신설했지만, 로스쿨 유치 실패 후 자율전공학과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자 2012 년 자율전공학과를 폐지했죠. 또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융합문화예술대학을 만들고 그 안에 메이크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등 5 개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어감상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산학협력형 대학개편 외 또 다른 대처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예술 분야가 또 다른 경제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어 남이섬 관광에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의견 있으신가요?

이지원: 한국에 제대로 된 관광사업을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를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유흥의 메카로 조성한다거나 전주 한옥마을을 전문적으로 조성해 브랜드마케팅을 한다면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세영: 맞아요. 한국사람도 한국에는 놀 곳이 없다고 해외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한국에도 제대로 놀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이용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높인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관광사업을 육성하면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김현경: 물론 좋은 의견이지만 위험도 상당합니다. MB 정권에서 추진한 4 대강 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녹색관광문화 형성이었고, 사업유치를 하면 34 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었지만 현재상황을 보면 처음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 없잖아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거대한 사업말고,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대세잖아요. '강남 관광상품'을 개발해 단기적으로나마 외국인 관광을 유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록 시작은 작지만 문화예술과 관광을 합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보라: 좋네요. 강남은 많은 기업들이 밀집되어있는 사무적인 도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클럽이 모여 있고, 코엑스 같은 복합 쇼핑단지가 자리잡은 곳이기도 하죠. 이런 양면성을 이용해 '역동적인 도시'라는 타이틀로 강남 관광상품을 만든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싸이의 노래 가사랑도 부합고요.

또한 관광과 같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므로 외국인 유치와 동시에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것처럼 위기상황일수록 큰 관광단지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일에는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경제위기를 실감하고 있으며, 그 극복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취업난과 물가상승을 통해 위기를 실감하고 있으며 그 대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실 강화, 전문대의 산학협력형 학과개편 그리고 관광산업 유치를 제시해주었습니다. 토론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⑪ 청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세계 경제가 위험하다. 물론 위험하다는 말은 상대적이다.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체감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 유럽의 금융위기 여파, 물가상승, 일자리 감소 등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른 어느 시절보다도 힘들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해 대비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철우 : 이번 2 차 스터디모임 주제는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입니다. 방송을 통해 과거부터 경제위기란 말은 수없이 들어 왔지만, 학생 신분으로서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은 경제위기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본 토론에 앞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경제위기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모 : 저는 학비와 용돈을 제가 벌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지만, 아무리 해도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과소비를 하는 편도 아닌데, 최저임금으로 밥 한 끼 사먹기 힘든 우리나라는 물가에 비해 임금수준이 정말 많이 낮은 거 같습니다.

■권예리 : 저는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이 경제위기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대기업이 성장해야 밑의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일명 낙수효과를 믿고 대기업을 밀어줬지만, 기업들은 이익을 본 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 안태식 : 성장일변도의 정책이 경제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선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춰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합니다.



■ 양나영 : 저는 무역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존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G20 국가 기준으로 약 110% 회원국 중 최고입니다. 물론 작은 국토, 천연자원의 부족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높은 대외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 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일자리 문제와 같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들 또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발생한 재정위기는 정부의 무리한 복지지출로 촉발된 채무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위기를 통해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변자민 : 그리스의 재정위기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자세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지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무상급식, 교육, 보육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방비와 고위 공무원 집단에 대한 연금 혜택 등의 지출입니다. 그리고 노동복지지출은 예를 들자면 빈곤층 지원, 국민 건강보장, 노령, 실업문제 등의 지출은 흔히 복지국가라 일컫는 독일보다도 낮습니다.

즉, 언론에서는 과도한 복지지출이 문제인냥 보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부유층의 세금 회피에 따른 재정수입 하락,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방비 지출은 증가, 그리스의 유로존 편입에 따른 화폐가치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거품현상 등의 재정악화로 인해 지금 현상이 터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규영 : 저 역시 자민 학생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라마다 처한 상황은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 역시 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때 저는 좀 더 정부의 복지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집단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과 하층민입니다. 이들이 흔들린다면 곧 우리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산층과 하층민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철우 : 네.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문제가 유럽에만 국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국제화 시대에는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쉽지 않지요. 이번엔 우리 국내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해주신 분도 계신데요. 계속 이어서 말씀 하시거나, 새로운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양나영 : 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존도가 높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는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는말도 되지만 반대로 국제시장이 좋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우리가 피해를 받게 된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무역은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더욱 높아진다면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 주권이 사라지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정부의 내수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태식 : 과거 IMF 와미국 발 금융위기 등 위기 속에 우리나라는 발 빠른 대처로 잘 헤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우리나라가 위험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 일수록 대기업들이 미래를 대비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투자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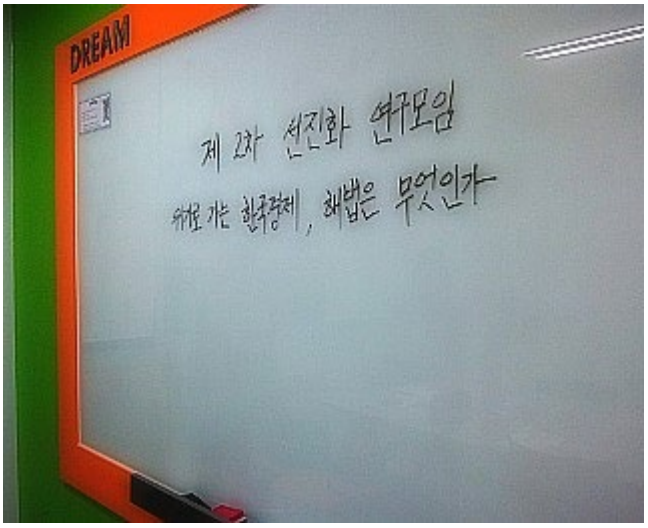
■안성모 : 현실에 맞는 임금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임금수준으로는 소비는커녕 저축하기도 힘듭니다. 하루 벌고 하루 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마다 정부가 소비세 인하, 부가세인하 등 단기적인 세금인하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물가수준에 맞는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권예리 : 저는 나영 학생이 말한 내수활성화 방안에 공감합니다. 특히, 저는 국내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심이 갑니다. 해외여행이 활성화된 오늘날 관광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중요한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 2010 년 기준으로 수입이 1 위 미국 다음인 2 등이었습니다. 관광산업 규모만 932 억 유로이고 GDP 의 약 1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스페인과 같이 세계적인 관광대국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통해외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철우 : 네.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다들 준비도 잘해오시고 말씀들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위기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토론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⑫ 경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지난 10 월 10 일,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은 '다가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길이 과연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08 년, 유럽 발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 재정수지 적자 극복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정수지 문제에 있어서 이미 쌓인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완전한 안정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제위기는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에도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본 결과 **우리 경제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경제위기를 도울 수 있을 것인지 미흡하나마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기업의 모습,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정해경(국관 2) : 우선, 이렇게 두 번째 모임에도 참석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번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의 주제는 크게 보면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인데 여기서 세계의 경제 전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경제만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 내가 지난 번에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들 알아봤니??

모두 : 응!

정해경(국관 2) :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토론할 부분은 바로 그 동반성장위원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야.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관한 것이지.

사실 이번 월례토론회에서 나눈 주제는 2008 년 유럽 발 금융위기로 인한 여러 국가의 재정수지 악화문제 등 세계 경제위기에 관한 것이었어. 저번에 나눠 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재정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한 경제 복구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를 맞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은데,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그나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업의 문제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 보려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도 세계 경제위기 상황을 놓고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도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Win-Win** 이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먼저 이에 대한 찬반의견을 좀 나누려고 해.

현경, 아영 ,지은(국관 2)은 반대, 아리는 찬성, 기현은 중도의 의사를 표현.

정해경(국관 2) : 역시 찬성보다는 반대의 의견이 많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니? 한 명씩 자유롭게 이야기해볼까? 먼저 아리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김아리(국관 2) : 음, 우선 나는 경제학과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일은 불가능보다는 가능한 측면을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물론 대기업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네가 알려준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감시기구 등이 있다면,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

김아영(국관 2) : 물론 감시기구가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가능하겠지.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그곳에서도 기업들 간의 가격 담합이라든지 불공정거래 등을 감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지.

김아리(국관 2) : 그렇다면, 그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시하는 기구를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정해경(국관 2) : 그러니까 아리 너는 **감시기구 위의 감시기구**를 만들자는 거야?

김아리(국관 2) : 말하자면 그런 것이지. 그래야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정해경(국관 2) : 하지만, 감시기구 위의 감시기구를 계속해서 만들다보면 재정적, 인력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감시기관의 정당성**도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김아리(국관 2) : 음,,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만 보면 모든 사회적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없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 나무가 사라지면 숲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 이 말처럼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정해경(국관 2) : 그래,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겠지? 그렇다면, 아영이 너는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해?

김아영(국관 2) : 나는 일단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의 이중구조**가 너무 심화되어서 그것을 타개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 왜냐면 기업이 생산을 하고 가게에서 소비를 할 때에, 나는 기업의 윤리적인 면보다는 얼마나 더 싸고 품질이 좋은가를 보고 선택을 하거든.



정해경(국관 2) : 근데 네가 말하는 산업의 이중구조 심화라는 게 무슨 말이야?

김아영(국관 2) : 산업의 이중구조라는 건, 대기업의 수는 적은 데 생산량의 차지 비중은 더 크다는 걸 말해.

윤현경(국관 2) : 맞아, 우리나라 대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8%나 되더라구.

김아영(국관 2) : 그리고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은 '재벌 기업'이라는 것이잖아. 이 '재벌 기업'이라는 용어가 나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된다고 들었거든,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 기업'이라고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들 것 같고,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우수한 인재들을 대기업에서 유출해가는 현상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

정해경(국관 2) : 우리나라에서 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말이야?

김아영(국관 2) : 그렇지. 조금 더 우리나라가 여유가 생겨서 '아, 저 기업은 사회에 좀 더 공헌하는 기업이래' 라면서 그 기업을 선택하는 등의 풍토가 생겨나면 가능성은 있겠지.

정해경(국관 2) : 그렇구나. 그럼 현경이는?

윤현경(국관 2) : 나도 아영이랑 비슷한데, 우선 내가 기사에서 본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 입사했던 사람들 중에 6 개월도 안돼서 그만두는 비율이 40%정도고,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20%정도? 그렇더라고. 그렇게 중소기업에서 퇴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더 좋은 대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솔직히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대기업에 가고 싶겠지. 이렇게 인적인 문제부터 차이가 나는데,, 과연, 상생을 할 수 있을까?

정해경(국관 2) : 하긴, 대기업에 갈 수 있다면, 중소기업을 포기하는 편이 낫겠지..... 지은이는?

김지은(국관 2) : 나?, 음,, 나는 왜 안 된다기보단, 우리 오빠가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회사가 현대 본사에서 이어지는 벤처기업 같은 곳인데 오빠 회사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본사에 가서 결재를 받거나 하는 일을 할 때, 본사에 있는 20 대, 30 대정도의 직원이 머리에 서류를 던져가면서 화를 낸다는거야. 무조건 아저씨가 그 대기업 직원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중소기업은 매번 적자가 난대.

정해경(국관 2) : 현대와 연계된 벤처기업인데 적자가 난다고?

김지은(국관 2) : 응, 그렇다고 하다라고. 물론 그런다고 월급을 주지 않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회사 자체에서 적자가 난다고 해.

정해경(국관 2) : 그럴 수가 있나? 아,, 참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 그럼 중도인 기현이의 의견을 들어볼까?



박기현(국관 2) : 나는, 왜 중도냐면, 음, 내가 찾아봤는데 몇 가지 우수사례들이 있어. 예를 들면 포스코와 세일 ENC 라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해외동반진출을 한 거야. 포스코 공사의 제안으로 2008 년에 세일 ENC 라는 기업이 실내발전소 공사에 참여했는데, 현지 상황들이 어려웠던 것이지. 노조라든지, 노동법 등에 의해 많이 힘들었었는데, 포스코 공사에서 재정적으로나 인적인 문제를 지원하게 되면서 칠레 현지회사가 포기했던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대. 물론 포스코 역시 이것을 제안한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하기는 하겠지. 하지만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중소기업이 그곳에서 성공을 하고 나니까 페루 등의 다른 3 곳에서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대. 이런

사례를 보면 동반성장이 아예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기도 하고 대기업이 윤리적인 목적으로 활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대기업들도 어느 정도 손익이 맞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지. 솔직히 삼성 본사에서는 이런 거 참여하지 않아도 충분한 이득은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치우치게 되면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해경(국관 2) : 뭐가 사라진다는 거야?

박기현(국관 2) : 동반성장이라는 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김아영(국관 2) : 나도 어디서 기사를 봤는데, 갤럭시 3 가 출시될 쯤에 어떤 하청업체에서 부품을 밤새가며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잠도 못자고 만든 것이지.

윤현경(국관 2) : 나도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일한 곳이 LG 배터리 하청업체였어. 그때도 물량 맞추느라 여자는 일찍 들어갔지만, 당시 같이 일했던 오빠들은 새벽까지 일했었대. 왜냐하면 물량을 못 맞추면 하청이 끊기게 되니까..

정해경(국관 2) : 물량을 한 번 맞추지 못하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거야?

윤현경(국관 2) : 응, 물량이 제 시간에 맞춰지지 않으면 아예 만들어진 제품까지 되돌려진다고 해.

정해경(국관 2) : 그렇구나, 그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마워. 그런데 여기서 잠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될 때, 너의 적성에 맞는 일인 중소기업이 있고, 너의 적성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는 일을 대기업에서 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느 곳에 취업할 거야?

현경, 지은, 아리, 기현 : 나는 중·소기업!!

아영 : 나는 대기업!!

정해경(국관 2) : ?? 이게 무슨 일이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말한 거랑은 너무 다른데?

김아영(국관 2) : 맞아, 나는 대기업 갈꺼야.

정해경(국관 2) : 왜? 왜 중·소기업에 가고싶어?

윤현경(국관 2) : 음, 나는 내가 너무 낙관적일 수도 있지만, 대기업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지은,기현,아리 : 나도.

정해경(국관 2) : 그러면, '세상은 비록 상생할 수 없고, 많은 이들은 대기업을 원하지만 너희들은 중·소기업에 가겠다.' 이 말이야?

지은, 기현, 아리, 현경 : 응. 우린,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지.....!!

정해경(국관 2) : 그렇구나, 이 주제를 가지고 재밌는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아영이는 왜 대기업에 가고 싶어?

김아영(국관 2) : 나는 솔직히 사회적인 면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아.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나 내가 느끼는 만족감? 그런 것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아.

정해경(국관 2) : 그럼 개인의 행복은?

김아영(국관 2) : 개인의 행복? 나는 그런 것은 굳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정해경(국관 2) : 그렇구나, 결국 자신의 정신적인 행복과 물질적인 만족감, 혹은 사회적 시선 중에 어느 것을 중시하는지는 개인의 몫이겠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 애들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루빨리 웃으며 상생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할게.



선진화 과제 9: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 II)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공수진(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선비 정신의 함양

한국의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의 성공 경험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맞물려 계층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최소해 나갈 것인가가 오늘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선진화포럼은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Ⅱ) 주제를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로 정하고, 관계 전문가를 모시어 새로운 비전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우선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 과정에서 '성장과 분배'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깊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각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유가치 창출 개념인 CSV 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박연수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초빙 교수는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교육은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게 해야 하며, 개발의 수준과 질을 끝까지 확보하고, 에너지절감형, 숲 확장형 도시의 확보와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의 내용적 공급에 투자하며, 생존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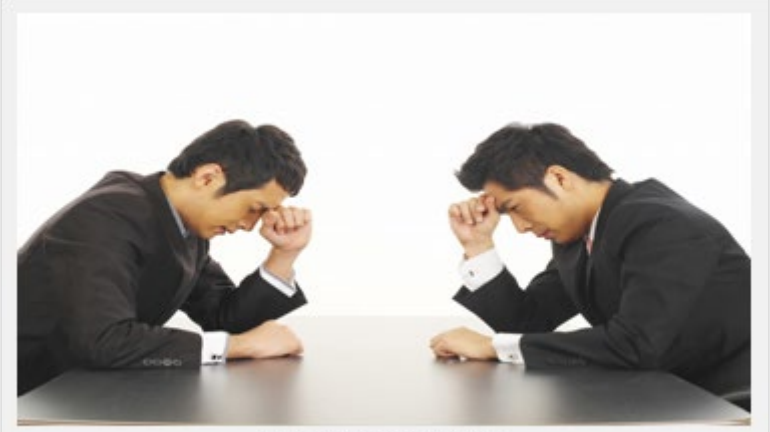
공존이 필요하다

곽삼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착한 선진화 교육의 실천 방안으로 시스템 구축, 국민의식전환 교육, 사회적 실천운동, 현장에서의 실천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 교육과 학부모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며 선진화포럼과 기업 간의 연계 또한 강조했습니다.

우선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경제와 정신·문화 융합 착한 선진화의 실천 방향으로 선비 정신을 본받는 도덕 사회를 지향하고, 저비용·고효율 복지 인프라로 공감 사회를 구축하고, 실사구시·경세치용의 절제 사회를 만들어가고, 일과 삶의 균형으로 문화적 행복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저성장·양극화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 전략의 수립이 시급합니다. 1 인당 GDP 가 28,000 달러 수준에 진입했지만 이에 상응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비용은 큰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 대상 24 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고, 이 때문에 지급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대 246 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태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 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1 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21% 늘어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것은 한국의 정신문화 측면에서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정부 지출과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GDP 를 증가시키지만, 환경 오염과 같이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GDP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보건, 교육, 환경 등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지표인 행복 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GDP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8 개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은 47 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발표인 2013 년과 비교해 6 단계 낮아진 것입니다. 물론 행복은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이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평가되는 행복 지수가 낮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 프레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문화적인 선진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며, 경제적으로는 절제하여, 풍요로운 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 한국 사회의 모범적인 국민의 상을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공공질서에 순응하여 따르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공평무사하고, 궁극적으로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선비 정신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선비는 개인의 안일보다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도덕적인 삶과 학문적 성취에 대해 결연한 의지와 행동을 나타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수준 높은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이질적인 존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선비 정신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계층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비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② 권새암(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와 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선진화포럼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경제와 정신·문화 융합 선진화,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선진화, 자연과의 공존, 착한 선진화 교육과 착한 선진화 운동의 전개에 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논제가 제시된 배경으로는, 물질적으로만 성장한 한국이 최근들어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적으로 한국이 잘 발전하지 못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선진국으로서 경제 성장을 할 때에는 국민행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행복이 떨어지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일할 의욕이 저하되며 창조, 협력이 무너집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 발전과 정신·문화를 융합하는 선진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환경 보전, 교육의 선진화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선진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경제와 정신문화의 융합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김용하 교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여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한국이 크게 저성장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을 활성화시켜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비스업을 통해 고용률을 향상시키고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김용하 교수는 UN 행복지수를 토대로 보았을 때 한국이 GDP 순위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소득 형평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며, 효과적인 복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는 피로 사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내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 문화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도덕, 공감, 절제, 문화를 통해 성숙 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용하 교수는 정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선비정신에 기초한 도덕 사회를 구축하고 사교육비, 허례허식, 음식쓰레기 등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절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감 사회 구축을 위해 복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파레토 법칙을 보완하고, 경쟁적 성과주의와 복지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2 차적 보장 시스템, 기회의 균등을 위한 1 차적 배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문화사회의 창달을 강조했습니다. 동일한 물질적 수준에서도 더 높은 행복을 위해서는 예술, 스포츠, 문학, 놀이 등의 발전이 필요하며, 특히 놀이 문화는 창의성, 의사소통 발달에도 중요하므로, 문화적 발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물질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 영역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가 발달하면 그와 관련된 서비스 업종,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므로 분명 경제 성장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정신, 문화의 발전을 이루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최근 한류가 많이 전파되고, 각 지역의 축제 등이 활발해지면서 정신, 문화적 콘텐츠는 성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이를 충분히 누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최상위권이라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강한 노동 강도에 시달려 주말에 문화생활을 누리기보다는 쉬기 바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 문화의 선진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 시간을 빨리 줄여나가야 합니다. 과도한 노동 시간은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과도한 노동으로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지면 생산성은 더욱 감소합니다.


노동 시간을 줄여 사람들이 여유를 갖는 것. 문화 발전의 길이다.

노동 감시 기구를 강화하여 정규 노동 시간을 지키도록 각 사업장을 감독하고,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시장질서로, 이와 같이 하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 시간을 전산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사업장에 근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 기계 설치 및 보고를 의무화하거나 세제 등 혜택을 주고, 이 근무 시간 보고를 취합하여 근무자들의 노동 시간을 감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노동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의 체제를 바꾸기란 쉽지 않기에, 일단은 대체 휴일, 공휴일을 조금이나마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체 휴일은 최근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일이 늘어나면 사람들의 소비도 촉진되기에, 경제에도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 시간을 차근차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이 피로 사회라는 말은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적 풍요, 정신, 문화적 선진화는 한국에 시급합니다. 국민의 행복도가 감소하는 나라는 성장 동력을 점차 잃어버리고 쇠퇴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루바삐 문화 발달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③ 권혁찬(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근 대한민국에선 이른바 '헬조선 신드롬'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저성장과 그로 인한 최악의 고용한파는 청년들의 도전정식을 좀먹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선 지난 10 월 30 일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경제와 정신문화 융합 선진화 방안'에 대해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학장은 다시 고도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니 저성장의 기조에 맞는 장기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착한 선진화 구축 방안'으로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모범적인 동반성장과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중요시할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였던 '자연과의 공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박연수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초빙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 자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을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개발반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과 탐욕의 절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착한 선진화 교육의 방안'의 발제자는 곽삼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였는데 착한 선진화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감사 나눔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수출부진과 더불어 신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고립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뉴스만 들려올 뿐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유례없는 저성장은 지난 80~90 년대 초반까지의 초고속 성장과 극심하게 대비되며 세대 간 갈등을 부각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국가부채와 체감실업률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로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생인 저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긍정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정말 조그마한 변화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나비효과처럼 큰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젊은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에 숭고한 젊음을 바칠 수 있는 도전정신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특히나 80 년대~90 년대 초반을 제외하고 언제나 대한민국은 어쩌면 현재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시점에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변화로 시작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모든 대학생들이 획일적으로 실제 업무에서의 생산성 향상과는 괴리된 이른바 스펙쌓기라 불리는 자격증 취득에 치중하며 사회적인

낭비에 힘을 쏟는 것보다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전문성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젊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긍정적이고 열린 태도가 도전정신을 가져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근원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작은 시선의 변화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매우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까요?

④ 김다솜(건양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한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측면, 강한 국력 등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겠지만 이제는 정신적, 문화적인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선진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한국에게도 이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지난 10 년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긍정적인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1 인당 국민소득은 3 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성공경험은 현재에 들어서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현상과 맞물려 계층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새로운 이상향인 선진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10 월 30 일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라는 주제로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제는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를 지향해야 할 때

좌장은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맡았으며, 총 4 가지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와 정신문화 융합 선진화 방안' 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학장은 물질 만능의 소비를 통한 만족추구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토론을 맡은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와 정신문화의 융합과 함께 실천 가능한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뢰사회 구축, 부정부패 척결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착한 선진화 구축 방안' 주제의 토론에서는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가 저성장양극화 시대에 자본주의 갈등 치유의 대안으로 공유가치창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자인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csv 의 전략적 투자 판단,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착한 선진화 교육의 방안 : 착한 선진화 운동의 전개와 확산 방안' 부분에서는 발제자인 곽삼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다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역량개발 교육과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토론자인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은 산업화시대의 추격형 인간에서 선진사회에 적합한 성찰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공존, 어떻게 할 것인가'섹션의 발제자인 박연수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초빙교수는 한국의 자연과 환경의 실태를 진단하고 진정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자연과의 공존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자연을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에 점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자연환경과의 공존 문제가 빠질 수 없습니다. 최근 유례없는 가뭄으로 최대 농업용 저수지인 충남 예당호가 바닥을 드러내고 급수를 제한하는 등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과의 공존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연이 생명의 터전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스승으로 삼고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릴때부터 자연체험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연은 21 세기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인 창의력의 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자연을 우리가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명명백백하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을 통해 '자연의 보존과

훼손 방지는 우리 모두의 일’임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연보호’라는 것을 막연하게만 느끼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서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어야 하는데요, 간혹 TV 프로그램이나 주변에서 손에 흙이 묻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흙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만물의 어머니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연의 일부임을 가르치는 것부터가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교육의 시작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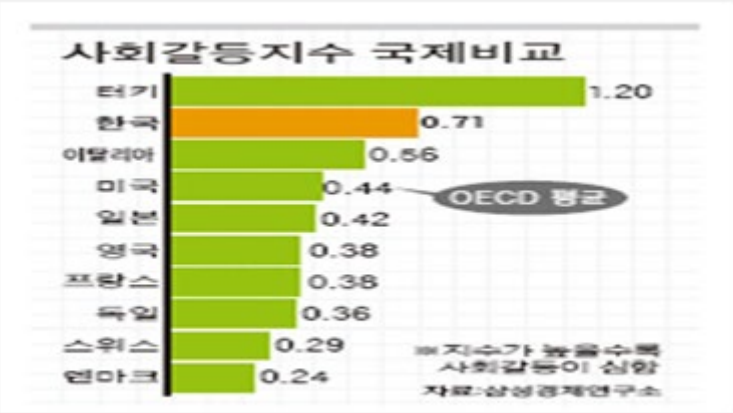
어릴 때부터 자연과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중요하다

딱딱하게 자연을 책속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 뛰노는 학교라는 공간자체를 자연친화적으로 형성하여 자연속에서의 예술활동이라던지 체육활동을 통해 공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야외활동을 통해 등산이라던가 텃밭가꾸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아이들이 자연을 소꿉친구삼아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21 세기 선진화 운동은 이제 단순한 경제 발전만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야말로 장차 한국이 세계 무대에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자연이라는 소중한 토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를 잘 보존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자연과 호흡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한국이 착한 선진국으로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⑤ 김덕규(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삼성경제연구소, 2010) 사회갈등비용은 연간 82조 원입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굉장히 다채롭고 가파릅니다. 물질적인 성장으로 보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층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등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선진화포럼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구상하였습니다. 경제, 공유가치, 자연, 교육 4 가지의 관점에서 착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경제와 정신·문화 융합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선비정신에 기반한 도덕사회, 효율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공감사회, 검소함을 강조하는 절제사회,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행복사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주하 서강대학교 교수는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다수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야 하고 보다 포용적 사회, 열린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착한 선진화 구축 방안에 대해서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정부와 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였습니다.

노사는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바탕으로 공유가치를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하고, 정부는 실효성 높은 세율을 걷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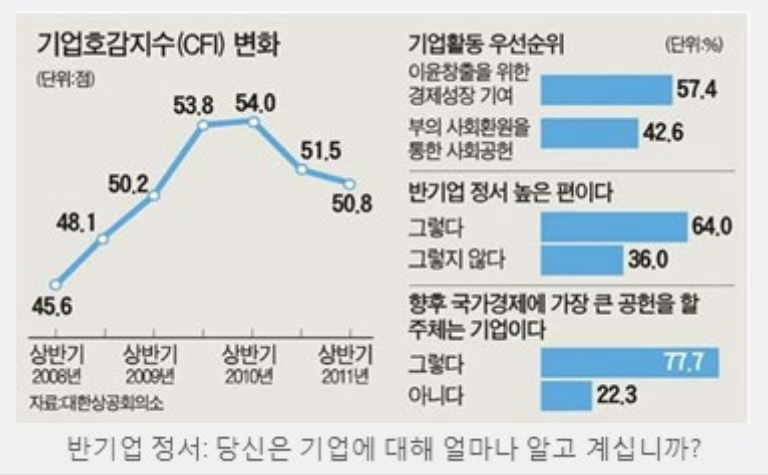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국민적 정서로 인해 국회에서는 논의되어야 할 경제 정책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에 대하여 박연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UN 이 발표한 행복 지수 세계 10 위권의 국가들은 모두 환경 분야에서 상위 10 위권에 있음을 제시하며, 자연 상태는 국민의 행복과 직결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존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신숙원 서강대학교 교수는 마찬가지로 자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교육을 제시하였습니다.

곽삼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착한 선진화 운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양적 가치를 한국 사회는 재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인성 함양과 사회적 시스템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은 추격형 인간에서 성찰형 인간으로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내면의 가치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기업 정서: 당신은 기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 공유가치, 자연, 교육 4 가지의 관점 중 저는 공유가치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이란 단순히 기부하는 활동을 벗어나 기업 핵심 역량과 연계된 사업을 통해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최근 많은 기업이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지만, 반기업 정서가 만연하여 기업이 맹목적으로 비난만 받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기업의 행정 처리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한다면 착한 선진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여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을 적극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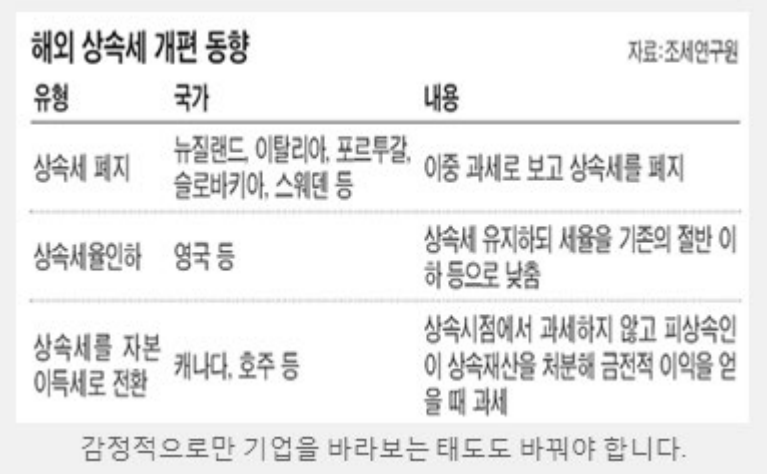
반기업 정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탈세, 소득 양극화 등에서 생겨났다고 보입니다만, 이제는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버려 맹목적으로 국민이 기업을 혐오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 증세뿐 아니라 보편 증세도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는 부자 증세만을 외치고 있으며, 국회는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복지 얘기만 하지, 세금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업에 대한 맹목적 불신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소득이 향상되고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고용 증가를 야기하는 등의 긍정적 결과를 불러옵니다. 즉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국민적 정서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 법인세에 대한 이해 없이 맹목적으로 비판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반기업 정서는 기업의 국내 활동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점점 많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지요.

기업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80% 정도가 5 년 이내에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생산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실업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상속세 개편 동향 자료:조세연구원

유형	국가	내용
상속세 폐지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이중 과세로 보고 상속세를 폐지
상속세율인하	영국 등	상속세 유지하되 세율을 기존의 절반 이하 등으로 낮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	캐나다, 호주 등	상속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때 과세

감정적으로만 기업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꿔야 합니다.

뜨거운 감자인 상속세에 대해 국민은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실제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음에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반기업 정서는 일반 국민뿐 아니라 공직 사회에서도 만연합니다. 공무원은 기업을 믿지 못하고 기업은 일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업에 대한 많은 규제를 걸고 있습니다.

기업이 하나의 사업을 하는 데에도 수많은 규제가 있어 사업성보다 행정적, 법적인 여건을 확인하는 데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규제완화를 보고 맹목적으로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국민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은 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볼까요? 저도 물론 기업 경영 방식이나 때때로 터지는 오너 일가의 부패성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연 초마다 일벌백계의 어조로 기업을 상대합니다. 이는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반기업 정서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에 대한 '벌주기'식 태도를 언론에서 지양해야 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교육적으로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국민이 알지 못하고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듯 국민이 기업에 대해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기업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정부의 부정적인 대기업 대처가 개선될 때 맹목적인 반기업 정서는 완화될 것입니다.

기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채찍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해서도 정부는 당근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를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기업 정서가 기업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을 한다면 긍정적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부정적 시각은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이익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국민이 모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공유가치 창출에 반기업 정서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기에 언론에서 보이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일벌백계식 태도가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필요 이상의,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선으로 기업을 바라보는 태도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착한 선진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맹목적으로 존재하는, 또 감정적인 국민 정서로 인한 반기업 정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나종문(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저성장과 맞물려 사회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10 월 30 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라는 주제로 10 주년 기념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 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성장이 멈춘 저성장 시대가 되었고 사회에서는 계층과 이념의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등 심각한 갈등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논의하고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 주년 세미나를 열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경제와 정신문화 융합 선진화 방안'입니다. 발제자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저성장 상태에서 경제 활력을 조금이나마 불어 넣기 위해서는 정신적, 문화적 풍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간의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 행복'을 강조하며, 김용하 교수는 생산측면에서 고비용 저효율을 바꿀 혁신이 필요하고, 또한 서비스 산업의 후진성을 극복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선비정신'에 기초한 도덕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착한 선진화 구축 방안'입니다.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는 저성장·양극화 시대의 해법으로 공유가치창출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어야 하며, 임금격차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특히 주목하여 청년 1 명 더 고용하기 운동 등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가치를 통해 노사관계를 상생하는 구조로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자연과의 공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발제자인 박연수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초빙교수는 자연의 위기와 그로 인한 인류의 위기와 한국의 자연과 환경의 실태를 진단하면서 행복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자연과의 공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선진화 교육의 방안'의 발제자인 곽삼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착한 선진화 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학생과 교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1-3-10 실천모델과 감사 나눔 운동전개 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견이 다 좋았지만 특히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의 토론에 관련하여 한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기업은 고용시장이 너무 경직되었고, 저성장에 따른 경기 악화 때문에 더이상 새로운 정규직 인원을 보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경향 때문에 청년 실업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고용시장의 글로벌화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용시장은 국내의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취업하기는 힘들어지고, 회사 내부에서는 다른 기업에 재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직 채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 쪽으로 눈을 돌리게끔 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고용시장 자체를 세계에 내놓아 경쟁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시장에 해외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기업을 가기 위한 과도한 스펙경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기업들은 재취업이 쉽기 때문에 고용시장도 어느 정도 유연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던 인재들이 자신들의 실력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 인재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글로벌화를 통해 국내 인재들에게 높은 대우를 해주는 해외 기업이 들어온다면, 국내 인재들은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국내 기업 역시 해외기업에 인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인재들에 대한 대우를 더 좋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자체를 국제 시장에 내놓고, 국내 기업과 해외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원활하게 경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해외의 직장을 구한다고 하면 부담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 정책을 통해 해외 진출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동시에 해외 기업들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보조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시장은 일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면 고용시장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공유가치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⑦ 박상희(한성대학교 무역학과)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와 그 방안을 주제로 한국선진화포럼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경제와 정신·문화 융합 선진화,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선진화, 자연과의 공존, 착한 선진화 교육과 착한 선진화 운동의 전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논제가 제시된 배경으로는, 한국은 고도성장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한 뼘 다가왔지만 압축자본주의성장으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소득 불평등, 양극화 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2008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시장 중 하나를 치중하여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서로 협력하는 모델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정부, 시장,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개선하고 동시에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착한 선진화가 중요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토론자 곽수근(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유가치 창출의 전략적 투자 판단,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 구축,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창조적 혁신 자원의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발제자 양병무(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는 CSV 의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개념이 중요하며 기업내부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노사관계, 정부의 의지 등 각지에서 공유가치창출

철학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등 약점을 보완하고 공동체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같이 협력하여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키워야 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공유가치 창출 실천방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노조는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노동개혁을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불합리한 공정거래를 없애고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반기업정서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은 윤리, 투명경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 1 명 더 고용하기 운동을 통해 공유가치를 추구하며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장기간근로, 음주문화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공유가치 창출이 각 다방면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는 사회와 자신에게 모두 이롭다는 경제주체들의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며 특히 경제 행위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신이 부양할 가족이나 직원들의 밥줄을 챙기기도 바쁜 삶인데 사회적 가치인 공유가치에 대해 고려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공유가치 창출 철학을 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공유가치 창출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이 많은 대기업 CEO, 노사협력이 필요한 노조, 등 시장의 경제주체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

알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민낯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경제행위가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를 실행했을 때 얼마나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사내보유금이 증가할수록 실업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인건비 절약이 비정규직 노동자수를 얼마만큼 증가시키는지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경제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 공유가치 창출 행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유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말단 직원 일때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예비사회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요. 대학생들에게 공유가치의 개념에 대한 교육과 실천을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교육은 기업의 윤리경영, 투명경영이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가치 실천은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자신이 보람을 얻는 일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유가치창출이 확립된다면 삶의 질이 개선과 사회 갈등 극복을 통해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⑧ 송지나(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과거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 등 세계가 놀랄 만큼의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잠재성장률은 3.3%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된 인구구조로 인해 현재 제도를 유지할 시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지출이 GDP 의 25%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세대 간 갈등, 이념갈등, 계층갈등 등

심각한 사회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30 일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주제로 10 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상형 선진화 모델 구축 및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경제와 정신문화 융합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학장은 “인류 사회 전체가 고도성장하면서 고용과 분배가 개선되고 환경문제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 모멘텀을 만들기 이전에는 장기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물질주의적 소비를 통한 만족 추구가 아닌 실사구시, 경세치용, 근면절약 등 도덕에 기초하여 절제하는 풍요사회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행복관의 정립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제 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착한' 선진화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동체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 현재의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는’ 정책을 ‘개천에 사는 미꾸라지도 행복한 사회’로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개천의 미꾸라지도 행복한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토론자인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보다 성숙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경제와 정신·문화의 융합과 함께 실천가능한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신뢰사회 구축, 부정부패 척결, 지하경제 축소, 포용적 정치 및 경제제도, 복지확대, 소득양극화 축소 등을 강조했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착한 선진화 구축 방안 섹션의 발제자인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는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사회적 갈등 감소 방안으로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양 교수는 그 실천 방안으로 경영자는 선비정신과 자본주의 결합을 통한 공유가치창출 및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실천으로 반기업 정서를 개선하고, 기업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R&D 투자 방식으로 ‘청년 1 명 더 고용하기 운동’ 전개를 통해 청년 일자리 고용문제 해결을 고민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의지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기업과 노조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며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과 소통과 토론문화 활성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3 불 문제(불합리한 제도, 불공정 거래, 불균형 시장)를 해결하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을 구축하여야 한다” 등 10 가지 실천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토론자인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창조경제시대에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곽 교수는 기업의 성장방향으로 CSV 의 전략적 투자 판단,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창조적 혁신 자원 확보 등을 강조했습니다.

자연과의 공존 어떻게 할 것인가 섹션의 발제자인 박연수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초빙교수는 물질만능을 위주로 하는 삶의 가치, 과소비에 길들여져 있는 삶의 방식, 탐욕의 도구로 전락한 기술의 문제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연 환경의 실태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고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자연과의 공존이 필요하다

토론자인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자연을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자연과의 어깨동무, 즉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서로 더불어 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착한’ 선진화 교육의 방안: ‘착한’ 선진화 운동의 전개와 확산 방안 섹션의 발제자인 곽삼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할 때임을 언급하면서 착한 선진화 운동의 방안으로 개인의 인성 함양과 사회적 시스템 구축의 상호작용을 위한 시민역량개발 교육과 실천운동 전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자인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은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산업화 시대에 주조된 추격형 인간형이라고 지적하며, 성숙한 선진사회에 적합한 인간형으로 성찰형 인간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에 관한 한 빨리 빨리 정신으로 무장된 추격형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선진화 운동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양병무 교수가 말했듯 문화적 자아성찰을 통한 정신, 이념, 문화의 선진화 및 생산성 확보를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소신과 의지를 통한 장기적인 계획력과 이것을 이끌어가는 끈기 있는 실천력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와 미온한 의지를 보이면 국민들은 그만큼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정부는 절대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진화 정책을 펼 수 없으며 또, 믿을 수 없는 정부의 울타리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행복한 선진국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사회 여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부실한 계획력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도 등 역사왜곡 문제, 하시마섬 유네스코등재, 자국의 컨텐츠 홍보등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철저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을 이슈화가 되거나 이미 문제가 벌어졌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일관하고 있어 국격을 심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와 직결되는 나라의 이미지 관리 또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력과 꾸준한 실행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력과 실행력 부재의 문제는 비단 역사분야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몇 개월 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메르스 사태 또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질병 관련 대처계획이나 준비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미리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매뉴얼 등의 문제로 인해 초기에 진압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는 오늘날의 정부, 그리고 기업들의 문제점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초과학분야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투자가 밑받침되어야 한다는 단점 아닌 단점으로 인해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 계획력과 실행력의 부재가 단순히 한 분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바로 행정시스템 때문입니다.

정부는 5 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 산하 기관은 예산 확보를 위해, 기업은 대외적 홍보와 매출을 위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목표과 과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적 평가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기관에서 과학자들의 연구비용을 지원할 때 1 년에 2 편 논문 제출 등 단순히 논문의 수로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양적 평가 제도가 아닌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만이 꾸준한 연구 지원이 가능한 환경조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관련 부처나 법안을 제정 및 수정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5 년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시각으로 중장기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5 년마다 임기가 바뀔 때 잘 인수인계가 되도록 지금의 여야 대결 구도가 아닌 화합의 국회로의 개선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개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입식 교육의 탈피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해 이슈가 되지 않는 사항은 미루어 두고 있다가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식이 아닌 단순히 점수와 같은 숫자로 평가받는 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장기적 시각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대한민국의 발전 방안을 고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착한' 선진화라는 큰 목표 아래 세부적인 분야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꾸준한 실행을 뒷받침 해주는 각 관련 부처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와 매뉴얼 확정 및 정부의 일관적인 태도와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⑨ 용지수(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한국은 지난 10 년 간 선진화운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긍정적인 인식을 사회에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1 인당 국민소득은 3 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의 성공 경험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맞물려 계층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30 일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주제로 10 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이상형 선진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비전을 논의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경제와 정신문화 융합 선진화 방안'이었습니다. 발제자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학장이 나섰습니다.

김 학장은 "인류 사회 전체가 고도성장하면서 고용과 분배가 개선되고 환경문제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 모멘텀을 만들기 이전에는 장기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학장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모습을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는 사회' 보다는 '개천에 사는 미꾸라지도 행복한 사회'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착한 선진화 구축 방안 섹션의 발제자인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는 저성장·양극화 시대에 자본주의 갈등 치유의 대안으로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양 교수는 "경영자는 선비정신을 통해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반기업 정서를 개선하고, 기업은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1 명 더 고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의지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기업과 노조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3 불 문제(불합리한 제도, 불공정 거래, 불균형 시장)를 해결하여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는 등의 10 가지 실천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 '자연과의 공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발제자인 박연수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초빙교수는 전 지구적으로 맞닥트리고 있는 자연의 위기 및 그로 인한 인간의 위기와 한국의 자연과 환경의 실태를 진단하고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자연과의 공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 "'착한' 선진화 교육의 방안: '착한' 선진화 운동의 전개와 확산 방안"의 발제자 곽삼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선진화포럼 10 주년을 맞아, 정책 활동성과를 토대로 보다 직접적인 실천모드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역량개발 교육과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모두가 좋은 주제, 토론이었지만 저는 특히 '경제와 정신문화 융합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합니다. 모두가 '브랜드' 제품만을 찾습니다. 넓은 집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전부가 되어, 국민 전반의 '행복의 기준'이 획일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소비를 통한 만족 추구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는 절제된 소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잘못된 소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지표를 설정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는 소비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타인과 비교해 더 좋은 물건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꼭 필요한 물건만을 구매하도록 해 분명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기업 또한 제품 연구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확립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네임밸류' 만들기는 소비자들을 줄 세우고, 기업이 '갑'이 되어 행복과 경제력의 기준을 '비싼 제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유무로 판단하게 합니다.

절약정신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소비문화가 확립된 선진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지역 밀착형 대형 소비 센터인 '막스 앤 스펜서'는 전국 곳곳 주요 도시에 자리 잡고, 중저가 상품을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젖줄' 역할을 합니다. 이 업체 상품의 특징은 브랜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류에서부터 구두, 학용품, 스포츠용품, 주방용품 등을 두루 갖췄으나 어느 품목도 자신의 '출신'을 과시하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철저한 실용정신을 담아 브랜드 값과 광고 선전비 등의 거품을 줄여 합리적인 가격을 창출한 매장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국민 대부분이 물건을 아껴 쓰고, 바꿔 쓰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유행이 지났다고 새 옷이나 다름없는 옷을 장롱에서 썩히다 한꺼번에 쓰레기통으로 쏟아버리는 우리네 소비행태와는 대조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프랑스도 전국 곳곳에서 벼룩시장이 열리지만, 파리시내의 대표적인 부자동네 '네이 유 씨르 센느'에서 열리는 벼룩시장도 열리기만 하면 대성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95%이상이 바로 쓰레기장으로 가서 문제될 일이 전혀 없는 물건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은 매우 진지하게 물건을 팔고 열심히 물건을 골라 자신의 생활에 적극 활용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낡은 것에서 향기를 느끼는 기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70~80 년, 심지어 1 백 년도 더 된 고가구를 자랑스럽게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일고 있는 일부 계층의 고가구 수집 붐이 골동품 수집 차원이라면 프랑스의 경우는 기능을 최대로 살려 절약해서 쓰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가정을 방문해 보면 3~4 대를 내려쓰는 가구나 물품이 즐비합니다. 1 백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칼과 포크, 때묻은 인형, 흠집난 찻잔 등등. 이 오래된 물품들은 그 자체로 아껴 쓰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손들에게 훌륭한 교육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려서부터 전통을 소중히 하고 오래된 가구들을 아끼며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중고물품을 함부로 버리거나 새것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배운 이런 정신은 건강한 소비문화의 근간이자 오늘의 프랑스를 선진국으로 지탱해주는 원천적인 힘이 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우리나라의 소비 문화를 개선하려면 국민 전반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절약과 저금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무분별한 소비 행태와 명품 브랜드만을 쫓는 분위기도 타파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가격대가 높은 명품 제품들에 다량의 소비세를 붙이고, 유아기부터 올바른 소비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타인과의 ‘브랜드 제품 소유 경쟁’에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국민 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소비를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획일화된 행복의 기준을 타파하고 선진된 소비문화를 도입하는 것도 ‘착한 선진화’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⑩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착한 선진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

한국선진화포럼이 10 월 30 일 금요일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라는 주제로 10 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선정 배경에는 최근 ‘헬조선’이라는 인터넷 신조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 3 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계층과 이념의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선진국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학자들과 함께 이를 논의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경제와 정신문화 융합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발제자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학장이 나섰는데요.



고도 성장보다는 장기적인 지속 성장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

김 학장은 “ 고용과 분배가 개선되고 환경문제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는 장기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피하다. 그러니 고도성장보다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두고 내실 있는 성장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착한 선진화 구축 방안’이였습니다.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는 저성장·양극화 시대의 해법으로 공유가치창출을 제시했습니다.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이 되어야 하며, 임금격차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특히 주목하면서 기업들의 청년 1 명 더 고용하기 운동 등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가치를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자연과의 공존 어떻게 할 것인가’였는데 발제자인 박연수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초빙교수는 자연의 위기와 그로 인한 인류의 위기와 한국의 자연과 환경의 실태를 진단하면서 행복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자연과의 공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인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공존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주제인 ‘착한 선진화 교육의 방안’의 발제자인 곽삼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착한 선진화 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학생과 교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1-3-10 실천모델과 감사 나눔 운동전개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한 가지 정책을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업과 대학에서의 선진 인재 등용 제도'입니다. 먼저, 입시전형면에서는 타인의 모범이 되고 올바른 준법 정신과 정치관과 경제관을 가진 청소년을 판별해 선진 인재 전형으로 일부 학생을 뽑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선진화라는 덕목을 넣어 평가 요소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다녀도 외국인에게 우리나라가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설명 못하고 역사를 모르고 준법 정신이 부족한 기업 사원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일부 사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그 회사 이미지 전체에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얼마나 선진화된 지식과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단순히 업무 역량만이 아닌 선진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입시와 입사에서 선진화를 평가 요소로 다루게 된다면 전국민이 이를 염두에 두면서 관심이 증대되며 이는 많은 교육 컨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조금의 시간만 지나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나라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착한 선진화의 시작을 입시와 입사 제도의 평가 요소 도입으로 시작하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선진 대한민국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⑪ 조준상(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국민 삶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즘 사회적으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1 인당 GDP 28,000 달러 수준까지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계층 간, 세대 간,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해 국민 삶의 질적인 측면은 날로 피폐해지자 생긴 신조어인데요.

최근 3 년 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출산율, 만족도, 행복지수와 1 위를 기록한 자살률, 노인 빈곤률도 이러한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외적인 경제성장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적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 10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렸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한국선진화포럼은 국민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10 월 30 일,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Ⅱ)에서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물질 만능의 소비를 통한 만족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와 정신.문화를 융합하는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양병무 인천재능대 교수는 공유가치 창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공유가치 창출 전략을 위한 10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박연수 고려대 교수는 현재 전 지구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자연의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환경을 망치지 말고, 기술의 개선을 통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삼근 이화여대 교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역량 개발교육과 그동안의 정책 활동성과를 토대로 한 실천운동의 전개와 확산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과거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세계 10 위권의 경제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정신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방안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개인,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4 가지 방안 중에서도 특히 양병무 인천재능대 교수의 공유가치 창출 전략에 관심이 갔는데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 경제의 3 대 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가 각각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개인은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이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공유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핵심역량을 구축하도록 하는 공동협력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등을 통한 단기적인 원가 비용 절감 추구에서 벗어나, 보다 큰 공유가치 창출을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효과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공유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법의 개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때에 따라 적합한 법과 제도를 통해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다시 한번 경제성장 신화를 이루자!

자본주의 4.0 시대를 맞아 세계는 지금 공유가치 창출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에게 있어, 국민 삶의 질적 개선과 착한 선진화를 위한 공유가치 창출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개인, 기업, 정부가 하나 되어 경제발전의 성과를 낸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협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⑫ 최민경(고려대학교 정경학부)



LTE 급 성장의 한국 경제, 현주소는?

LTE 급 경제 성장! 한때 원조 받던 국가, 아프리카의 빈곤한 국가들과 서로 더 가난하다고 다투던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은 지금까지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저 3% 내외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뿐더러, 낮아지는 취업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젊은 세대들마저 희망을 많이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즉, 저성장 상태라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이 창립 10 주년을 맞아 개최한 두 번째 기념 세미나에서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라는 제목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경제와 정신, 문화 융합 선진화 방안,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착한 선진화 구축 방안, 자연과의 공존 방안, ‘착한’ 선진화 운동의 확산과 전개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의 김용하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저성장 상태에서 경제 활력을 조금이나마 불어 넣기 위해서는 정신적, 문화적 풍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 간의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이 중요하다

‘국민 행복’을 강조하신 김용하 교수님은 생산측면에서 고비용 저효율을 바꿀 혁신 (innovation)이 필요하고, 서비스 산업의 후진성을 극복하며 무엇보다도 선비정신에 기초한 도덕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남주하 교수님께서도 공감하시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의 양병무 교수님께서는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간 협력, 소외계층에 관심,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선진화 등의 기업문화 개선을 강조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 곽수근 교수님도 동방성장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 기업의 역할을 토론에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대학원 박연수 초빙교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그린(green)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생존기술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야 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에너지 절감형 도시를 구축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서강대학교 신숙원 명예교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소소히 실천할 수 있는 자연 보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곽삼근 교수님과 한국교원대학교의 김주성 총장님께서는 ‘착한’ 선진화를 위해, 그리고 준법 정신을 갖추고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멋진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토의 주제 모두 ‘착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특히 문화, 정신적으로 여유를 갖는 국민이 되어야 함에 공감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 중 저출산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그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단결력과 협동심을 꼽습니다. 대학 강의를 듣던 중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았을 때 애국심이 강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긍지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정부패, 실망스러운 정치,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젊은이들의 미래는 행복 지수를 낮추었고 동시에 원망과 불신을 키워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없는 사회'로 다수에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진정한 선진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에만 너무 목메지 않고, 국민들이 문화, 정신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많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더 많이 만들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들에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자연 보존,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까지 얻는 방법! 다양한 보육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제공하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역시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는 방법!

즉,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는 첫째, 저출산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둘째, 문화 생활 공간을 확대시켜 사람들이 이를 더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청년들의 불만이 낮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대책들이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수치적 성과에 힘 쓰기보다 국민 만족도와 행복 측면에서의 성장이 시급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정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착한' 선진화를 이룬다면 질적으로 성숙한 선진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⑬ 최현수(홍익대학교 예술학과)



"다 함께 가는 선진화" 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0 월 30 일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는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라는 주제로 한국 선진화포럼이 개최한 10 주년 기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문화의 선진화부터 교육, 자본주의, 자연문제까지 폭 넓은 주제에 대하여 착한 선진화의 가치관과 목표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연수 교수님께서는 자연과의 공존을 강조하시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셨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공존을 이룰 수 있는 "착한 성장"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연의 착한 성장을 통해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곽삼근 교수님께서는 시스템 구축, 국민의식전환 교육, 사회적 실천운동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 착한 선진화 교육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적극적 실천운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용하 교수님께서는 정치, 경제적 문화와 정신문화를 융합하시면서, 착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신문화의 선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수님들의 다양한 말씀들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땅콩 회항 등 여러 반기업 정서와 기업 내부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착한 기업문화, 착한 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제자인 양병무 교수님 께서는 CSV, 즉 공유가치창출을 강조하시며 CSV 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사회적 책임은 돈을 벌어 기부하는 정도의 한계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등장한 개념이 CSV 이고, 이는 상생, 공생의 방법은 하나의 해답, 정답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공유가치창출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상생과 협력을 통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노사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노사파트너십이 CSV구축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자는 기업과 맞서 싸우는 대립의 이슈들과 개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자는 사실 함께 가치를 창출하고 서로를 돕는 파트너의 관계입니다. 노동자는 기업의 구성원, 기반으로서 기업이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노사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 서로 노력하고 변화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업과 노동자 모두 법과 원칙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우선적으로 지킨다면, 서로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어 상생의 노사파트너십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노동자 모두에게 준법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은 노동자가 단순한 이익 추구의 수단이 아니며 함께 나아가는 CSV 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인재를 가치있게 여기고 육성하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의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폭력성 등의 문제를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과 원칙을 지키며 기업을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 나가는 협력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계속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노동자 또한 기업을 구성하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와 함께 가는 노사파트너십을 통하여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가 함께 협력을 통하여 신뢰를 쌓고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더 선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⑭ 김수빈(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최근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온라인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세대 사이 갈등, 남성과 여성 사이 갈등,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배경에 대한 갈등 등입니다. 온라인이 편가르기 전쟁터가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만큼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를 과(過)데올로기 사회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자의 이데올로기가 뚜렷하고,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에 대해 배타적입니다.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터키에 이어 2 위를 기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계층갈등과 배타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자유방임적 경쟁 체제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 보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표현도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는 금수저를 따라갈 수 없다는 자조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기존의 자본주의적 체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재고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체제의 치명적인 단점은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방식은 결국 개인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의욕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효율성 또한 감소시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자본주의가 논의되어야 할 때입니다. 아나톨 칼레츠키는 저서 〈자본주의 4.0〉에서 공생적 자본주의, 즉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제창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용어와 ‘따뜻함’이라는 용어는 일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양한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국내외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 형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외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유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에서 더 나아간 개념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공유가치, CSV 의 개념입니다. 기업의 시혜적 사회공헌 활동인 CSR 이 기업 이미지 개선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반면, 시혜적 성격이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는 CSV 의 개념은 더욱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제 필자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공유가치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업들의 근무 환경이 쉽지 않다는 반증일 텐데요,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과도한 업무시간을 줄이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업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만으로는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상품을 소비하여 기업운영의 원천이 되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입니다. 국민들이 끊임없이 기업의 부정부패나 불건전한 문화를 견제하고 개선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임금 공유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출처: 연합뉴스 tv)

SK 하이닉스는 지난 6 월 협력업체와의 '임금인상 공유제'를 체결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긍정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들이 더욱 확대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혼자의 성공으로는 결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편을 나눠 싸우는 게임이 아닌,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진 3 출처: 연합뉴스 TV https://www.youtube.com/watch?v=igzV7_6OIas)

⑮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금격한 발전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유례 없는 압축성장, 완벽한 민주화를 이루어낸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빈부격차와 이기주의입니다.

빈부격차는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반기업정서가 팽배하게 만듭니다. 이기주의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애국자들이 사라지게 합니다. 따라서 빈부격차와 이기주의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의 선비정신이 필요합니다. 선비들은 개인의 안일보다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벼슬을 할 때는 공정한 일 처리를, 벼슬을 하지 않을 때는 학문을 닦고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을 보여주셨던 면암 최익현 선생

선비들은 수준 높은 공동체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자기계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신입니다. 선비정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추게 된다면 위의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선비들은 조선시대의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지금의 사회 지도층과는 달리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사회 지도층부터가 선비정신을 배우고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사회 지도층이 갖춰야 하는 덕목이 선비정신임을 강조하시고 선비정신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분들께서도 공동체와 국가가 있어야 기업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옛 선비들처럼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선비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선비들의 위인전을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선비정신을 익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 때는 도덕 시간에 가르치고 대학생 때는 교양 수업을 통해 선비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선비정신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선비정신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도 지금과 같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한국 사회가 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비정신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서 선비정신을 가진 젊은 세대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선비정신을 접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선비생활체험입니다. 안동, 단양, 영주 등 선비정신이 남아 있는 도시들에 선비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많이 개발하면 됩니다.

선비체험을 함으로써 선비정신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업 때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선비체험은 거부감 없이 즐기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선비정신을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사익보다는 공동체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언제나 자기계발을 하는 선비정신이 21 세기의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선비정신이 자리잡히고 모두가 선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빈부격차와 이기주의가 해결될 것입니다. 선비정신이 있어야만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경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⑯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부)



성장만을 중시했던 지난 한국경제

지난 한국은 뛰어난 경제성장을 일궈냈지만 많은 부정적 측면을 양산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경제발전의 성공 경험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맞물리면서 계층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한국 자본주의가 한계를 맞게됨에 따라 '공유가치 창출(CSV)'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제시되었는데요.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이 이익극대화에만 머물지 않고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가 등의 이익까지 생각하는 경영을 말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경제적 가치창출과 공동체적 가치창출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죠.

필자는 공유가치 창출에 대해서도 특히 '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효과에 집중했습니다. 대기업은 전체 국내기업의 1%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 99%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살아갈 수 있는 기업생태계가 몹시 필요합니다. 이런 생태계를 바탕으로 기업과 국가 전체가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동반성장!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협업과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히든챔피언들이 많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력의 혜택을 받아 독일은 제조업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에서도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되어 많은 부분을 고쳐나가고 있는데요. 동반위는 불합리한 제도, 불공정한 거래, 불균형된 시장을 개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인상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동반성장 지수 등을 통해 점차 상생의 이미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하는 대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높은 반기업정서로 인해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과적인 동반성장을 위해서 대기업의 이미지 제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대기업의 동반성장의 유인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대기업의 동반성장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동반성장을 잘 실천하는 상위 10 개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지상파 광고로 제작하는 것을 생각해보았는데요. 이를 TV 에서 접한 국민들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상생하려는 태도를 가진 존재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파급력이 큰 관련정부기관의 페이스북에도 우수한 동반성장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두 방법은 또한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반성장의 상위 10 개의 우수사례로 뽑히면 국민들에게 훨씬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열심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성장위주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다함께 더불어가는 '공유가치 창출'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살아가는 '동반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기업이 동반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국민들이 그런 대기업을 존중해주는 사회적 토양이 마련된다면 동반성장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로써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공유가치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한 한강의 기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⑰ 정우재(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불과 60 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아직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더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1 세기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화'의 문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OECD 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의 수준에 거의 도달했지만 소프트웨어, 즉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하드웨어가 성장한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휴유증은 개인의 삶의 질, 만족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숙되지 못한 시민 의식으로 인해 사회갈등이 만연하고 정세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성장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역동성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문화 활성화함으로써 타인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심화되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시기 동안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물적,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며 정신적인 풍요나 자연과 같은 것들은 도외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삶을 살아야 했고, 작금의 세태를 '헬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자연스레 타인에 대한 관심 저하와 심각한 이기주의, 개인주의적 세태를 가져왔습니다.

선진화된 사회를 위해서는 무릇 자기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며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여 모든 계층이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지금처럼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 꼭 논의되어야 하는 건전한 갈등으로, 그 성격이 바뀔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과 국회의원같은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먼저 나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소 보인다면 국민들도 반감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 경영자들은 공동체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좋은 것이 기업에도 좋다는 인식과 윤리관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구성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심화되는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적 사고방식과 공감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쟁하기 바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통하는 법을 까먹은 듯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각계각층이 자신과 다른 의견은 배척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기 바쁩니다. 자기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무조건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세뿐입니다.

소통의 기본은 잠시 자신의 의견을 내려두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 받으며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소통 방식을 체득화하면 상대의 입장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힐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공동체적 사고방식과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갈등 해결은 더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법을 몸에 익혀둔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토론을 할 때도 항상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는 틀림이 아닌 다름임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시험의 형태를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시험으로 프랑스의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가 유명합니다. 단순히 외워서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쓰는 시험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접하게 되고 생각의 폭도 깊어질 것이며, 사회와 스스로를 성찰함으로써 공동체적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태, 혹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심화된 것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첫 시작은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의식의 성숙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권새암 (서울대 경제 1) : 안녕하십니까.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빠른 물적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정신문화적 성장이 뒤쳐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국민들이 정신문화적 여유를 향유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노동 생산성 증가 및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어떻게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노동 시간을 단축시킬지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금태을 (서울대 경제 2) : 일단 노동 시간에 관해 한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선진 산업국가들 뿐 아니라 후발 산업국가의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장시간을 일할 뿐 아니라 많은 초과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이나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비해 약 600~1,000 시간 길며, 홍콩과 대만에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정상근로시간의 1/4 수준에 육박하는 방식의 근로관리 구조는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와 산재 위험 확률의 상승 등 기업경쟁력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근로자의 한계생산력은 하락하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던 기간 중에 노동생산성이 현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선진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 그와 관련된 노동 시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연단위 근로시간제(annualization)가 도입되는 경우, 즉 현재 2 주 또는 1 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1 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로 확대할 경우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이 크게 증대하여, 생산성이 증가하고 노동 시간을 자연스럽게 조절, 단축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홍 (서울대 화생공 2) :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근로 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등 한국 사회가 노동 시간, 생산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 생산성은 괜찮은 수준이지만, 서비스 부문에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3~40% 정도의 생산성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해야 궁극적으로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개방과 기술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생산성이 취약한 원인은 서비스 산업이 충분히 개방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국경 간 서비스 거래, 국내적으로는 서비스 인력의 이동이 제한적입니다. 더 적극적인 개방에 의한 서비스 산업의 노동력, 기술력의 향상은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나승모 (서울대 수의예 1) : 외국에서 사용하는 노동 시간 단축 사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일단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25~50%의 할증임금률을 적용하였고, 할증임금률을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스위스 등은 초과근로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고, 시간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보았는데, 사실 추가 근로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 관계에서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초과 근로에 대해 금전 보상을 받을지, 시간 보상을 받을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한다면, 생산성이 좋은 시기에는 추가적으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생산성이 낮은 시기에는 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하면서도 근로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새암 (서울대 경제 1) :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득을 더 올리고 싶어서 일부러 추가 근로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라고 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경영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법을 통해 근로 시간을 제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인과 사용자 간 자율적 협약에 의해서 추가 근로 및 그에 대한 보상 방법을 합의 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 노동 여건을 개선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신문화 선진화로 연결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에, 노동 개선이 정신문화 선진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여가 장려 및 문화 지원이나, 각 자치단체의 체육관, 문화시설 건설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노동 시간과 생산성을 모두 개선하고 정신문화 선진화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한국 국민들이 정신문화를 발달시킬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한국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청년 실업의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

나종문 (미디어 2):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우들과 함께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성장 상태에 머물고, 그로 인해 청년 실업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청년 실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이 많아지면서, 경제 활동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 다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의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이러한 청년 실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고려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청년 실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을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고용 시장을 국내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열어,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내 고용 시장에 있는 인재들은 해외 기업들이 탐낼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흐름처럼 일부의 인원들이 해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을 알아보고 취업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기업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오동현 (미디어 3): 저도 일단 동의합니다. 이미 국내의 인재들을 해외 기업에서 스카웃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내의 인재들은 해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회사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해외 기업 취업을 고려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에 대해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들처럼, 해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유민 (미디어 2): 한국의 젊은 층은 국내 기업이라는 좁은 길목을 뚫기 위해 너무 과다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을 통해 좁은 길목을 넓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지금 당장 해외 기업에 취업하라고 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외국어는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지 않고, 해외에서의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해외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담 역시 크기 때문에 막상 취업하라고 하면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을 통해 해외 진출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해외 기업에 대해 배우고, 해외 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거리낌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종문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 오동현 학우의 경우 해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유민 학우의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 해외 기업과, 해외 생활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승환 (미디어 2):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고용 시장을 해외로 넓히는 방안도 좋은 의견이지만, 저는 오히려 고용 시장을 해외로 넓힘으로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다 품을 수 없을 정도로 국내 고용 시장이 좁은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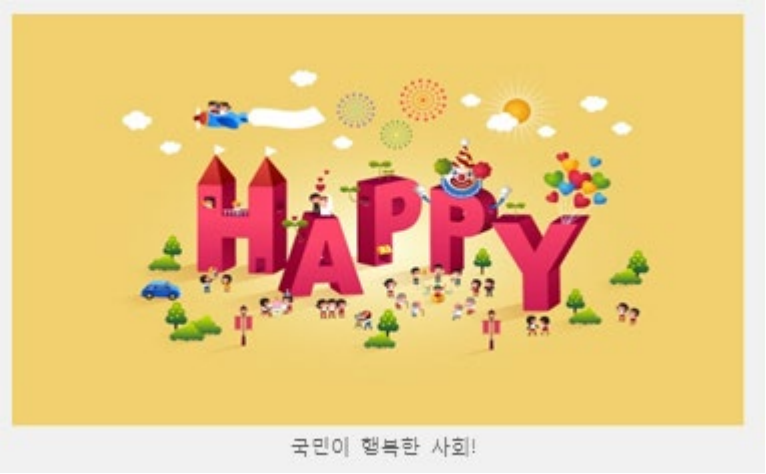
지금도 인재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인재들의 시선이 대부분 대기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시장을 해외까지 넓혀 좋은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하게 된다면, 국내의 중소 기업들의 인재난은 더더욱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고용시장을 해외 시장으로 넓히는 방안은 좋지만, 국내 중소 기업들이 인재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유민 학우의 의견에 덧붙여서, 국내 중소기업의 장점을 설명하고, 취업을 이끌어 낼 수 있게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건 (미디어 2): 저는 경력직 채용을 늘리는 것이 김승환 학우가 제기하셨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는 대기업에는 취업하기 힘들고, 중소기업은 대우가 좋지 못해서 인재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대우는 대기업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해외는 대기업들이 경력직을 위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인재난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서부터 자신들의 경력을 쌓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인재난에 시달리지 않고 대기업은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고용시장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을 쌓기 위해 인재들이 우선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경쟁을 통해서 인재들이 더 나은 대우를 하는 기업으로 취업하게 된다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종문 (미디어 2): 좋은 의견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은 청년 실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을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을 통해 해외 진출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국내 중소기업의 인재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의견들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여러분들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

최민경 (정경 1):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정경학부의 학우들과 함께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대한민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저성장 상태에 머물고, 청년 실업 문제 등 사회갈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제 활력을 조금이나마 불어 넣기 위해서는 정신적, 문화적 풍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저출산 해결 방안과 문화 생활 및 여가 생활을 잘 지원받고,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함께하는 '공유가치'를 창출하며 문화 생활을 개선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원을 더 많이 만들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들에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자연 보존,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까지 얻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측면에서는 다양한 보육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제공하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불신의 벽을 허물수도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학우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허준 (정경 1): 저도 일단 동의합니다. 그 밖에 문화 생활이라고 하면 전시, 관람 외에도 저는 운동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자전거 무료 대여와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적인 공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활동을 장려하는 효과를 보려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준영 (정경 1): 네, 동의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저는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문화 생활에 대한 지원 및 할인 정보 등도 많이 홍보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엔 영화, 공연, 문화재, 스포츠 관람, 그리고 전시 관람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이용료가 대폭 할인됩니다. 바로 '문화가 있는 날'있기 때문인데, 이 날은 2014 년 1 월부터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광고 및 공지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할인 및 제공 행사에 대한 홍보 활성화

채연정 (정경 1):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문화 및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공원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저는 국민의 전반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가진 자'들 뿐만이 아니라, 소외 계층의 문화생활도 보장해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8 월에서 12 월 동안 서울시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된 시민 계층을 위해 178 개의 공연 및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하여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해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거점 문화공간을 찾아가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순회공연'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점에 눈길이 갔습니다.



금전 뿐만이 아닌 문화도 나눔이 필요하다

박승연 (정경 1):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다뤄본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토의는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한 방안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저는 사회자께서 언급하신 보육시설 확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보육 시설들의 아동 학대 영상과 제보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보육 시설을 사내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육시설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부모들이 보육 시설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가 맞벌이이고, 이는 경제적 여건의 지원으로도 역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처럼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노력도 어렵겠지만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민경 (정경 1):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고, 특히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저출산 문제와 비롯해 문화 생활 및 여가 생활이 향상된 사회를 위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의견으로는 첫째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자전거 무료 대여와 같은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이미 진행중이지만 대중이 잘 모를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소외 계층의 문화 생활도 신경을 써야 전반적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넷째, 보육 측면에서의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강유정 (이화여대 교육 2) :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정부패 정도가 심하며 국민 갈등과 소통부재의 정도가 심각한 등 사회문화 면에서도 부족함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착한 선진화 교육을 통해 정신문화를 고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 중에서 특히 시민의식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구성원간 느끼는 귀속의식이자 유대감을 뜻하는 성숙한 공동체의식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김영주 (서울여대 영문 2) :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만한 환경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교에서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는 인식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요즘에는 대학교도 공동체생활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여자대학교의 바롬인성교육을 들 수 있는데요, 공감적 의사소통이나 창의적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과목들을 배우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공동체의식을 배우는 교육과정입니다.

소집단으로 운영되는 바롬은 매일 저녁시간에 함께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응용하여 무대를 만들고 토론하는 등의 과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단순히 공동체의식에 대한 수업을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합숙을 통해 직접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더라도 배운 지식을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합니다.

강유정 (이화여대 교육 2) : 서울여대의 바롬처럼 합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시민의식교육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보면, 공동체 생활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효과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최근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보다는 성적으로 줄 세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단순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상황만으로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조성과 더불어 교과과정 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도덕과 윤리와 같은 관련 교과에서 공동체의식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공동체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교육하는 도덕교과를 소홀히 여기는 풍토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연 (연세대 응통 2) : 청소년 시기부터 공동체의식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도덕교과를 경시하는 풍토를 바꾸어야한다는 점 또한 동의합니다. 이 의견에 추가하자면 동아리 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교입시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의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단순히 입시만을 위한 동아리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학교차원에서 동아리 유치나 활동내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아 (성신여대 소비자 1) : 학교가 청소년들의 주 생활 장소인 것은 맞지만,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가장 큰 생활 장소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교육이 단순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보다는 가족단위로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공동체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에서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근 지역단위에서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지역주민으로서 이러한 문화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분위기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강유정 (이화여대 교육 2) : 성숙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그 이후로는 도덕교과를 경시하는 풍조를 개선하는 등 공동체의식 교육의 내용면에서 질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아리활동을 활용한 공동체의식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며 지역단위의 문화행사에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겠습니다.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④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공수진(행정 2): 안녕하세요.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노사갈등, 지역갈등, 종교 갈등 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런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어 구성원들간에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조영신(행정 2):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지역 갈등 사례로 밀양 송전탑 사건이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은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밀양 시민과 한국전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입니다. 아직까지 큰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되는 중입니다.

저는 이런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것의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령기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교육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갈등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사고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려줄 것입니다.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김혜림(행정 2):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저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관련한 교육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력과 폭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방법이 진정한 문제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2 주에 1 권씩 효과적인 토론 방법, 토론의 방향 등과 관련된 책을 읽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책에서 읽은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실제 토론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론 수업

박지혜(행정 2): 근본적인 해결책이 교육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갈등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은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경제적인 부분에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는 부유층과 빈곤층 사람들 간에 심리적 괴리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유층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치품들은 빈곤층들에게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부유층들이 사치를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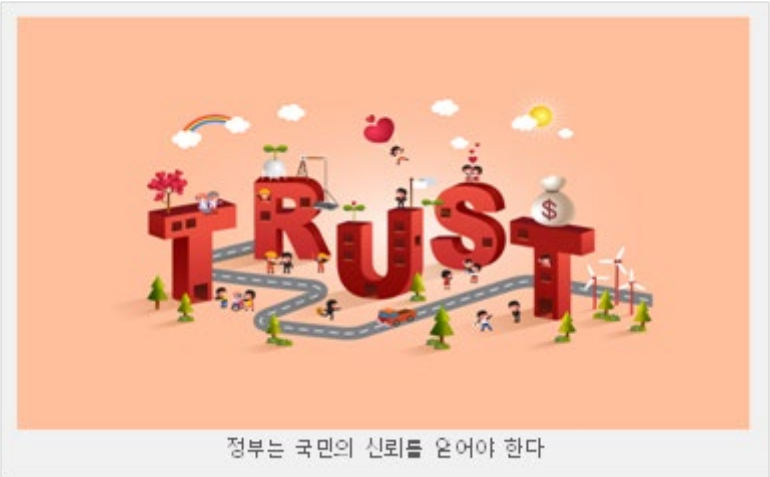
이의영(행정 2):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열심히 벌어서 번 돈으로 마음껏 쓰겠다는데 우리에게 이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유층은 누진세로 세금을 이미 많이 내고 있고 이 돈은 빈곤층을 위한 복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부유층 입장에서 굳이 한국에 살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 같고 이들은 이민을 하게 되며 이는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측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영(행정 2): 저도 이의영 학우의 말에 공감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유층, 빈곤층을 굳이 나누지 말고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말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일 뿐입니다.

부유층, 빈곤층의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고 태어난 상황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계산해서 공평한 삶을 살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을 하기보다는 실행가능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진실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서로 간의 갈등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문고' 제도처럼 국민이 보다 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진(행정 2):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해 토론하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 모두 감사합니다.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았는데요, 대학생들의 소박한 의견들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실천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⑤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권혁찬 (경제 3):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국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 월 30 일, (재)한국선진화포럼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Ⅱ)에서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세미나에선 '착한 선진화'의 방안으로 경제와 정신문화의 조화, 동반성장과 공유가치 창출, 자연과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시민 교육방법 발전방안의 네 가지 토론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주제 중 경제와 정신문화의 융합과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세미나에선 경제와 정신문화의 효율적 융합을 위해 구체적으론 공유가치창출과 기업의 고용촉진, 경영자에게 선비정신을 보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 분들과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김용훈 (경영 4) : 공유가치창출은 마이클 포터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그 이후에 큰 이슈를 가져온 개념입니다. 기업이 단순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이윤추구와 가치창출을 동시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라민 은행입니다. 그라민 은행은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에 대해 저리의 대출을 통해 크게 성장한 은행으로 이것이 바로 공유가치창출의 실질적인 기념비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수없이 많은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대부분이 정부지원 등 정책보조를 통해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영훈(경제 3) : 동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선비정신일 수 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 선비는 수적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통치계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서양으로 말하자면 노블레스 오블리쥬, 동양에서는 선비정신입니다.

사실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법교육과 법치의식입니다. 그에 반해 사회 지도층에게는 준법정신은 당연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함께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희생정신은 지금 경영자, 사회지도층에게 현재에도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희생정신과 도덕성 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완수되고 공유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민우(경제 3) : 그렇지만 기업의 공유가치창출이나 고용촉진을 가지고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이 되고 강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의 제 1 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 고용, 임금의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업을 압박하고 목을 죄어서 나오는 단순한 일자리의 대체, 보여주기식 투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용창출,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선비정신의 함양과 계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한국식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비록 대상이 자신의 상사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위주의에 기대어 명령을 하달하는 것이 아닌, 능력과 인성을 통해 정말 존경받는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는 자세인 선비정신이 요구됩니다.

이병훈(경제 3) :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견해로는 일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폭스바겐 사태야말로 선비정신이 결여되어 윤리경영을 실천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경영자들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이나, 혹은 휘하의 중간경영자, 일선경영자들이 받을 실적압박 등에 따라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선비정신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우리나라에선 연이어 발생하는 방산비리로 온 국민이 큰 심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선비정신을 통한 윤리경영, 비리를 근절하려는 태도, 나아가 사업보국의 정신까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혁찬(경제 3) :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선비정신을 함양하여 현재의 낮은 수준의 정신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더 살기 좋고 수준이 높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해지리라는 희망을 품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론 선비정신을 통해 윤리경영, 수직적 기업문화 개선을 비롯한

정신문화 발전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⑥ 건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오른 자연문제

김다솜 (건양대 국방공무원학) : 지금부터 건양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회갈등 역시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 10 월 30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산업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갈등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다양한 시각에서 '어떻게 자연과 공존하며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까'와 관련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경제정책을 만드는 공무원, 경제발전을 이끄는 기업인들이 자연의 가치를 깨닫고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며 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학교 안에 작은 숲을 조성한다든가, 텃밭을 가꾸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연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강민주(건양대 경찰행정학) : 김다솜 학우의 의견에 보태겠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에서 직접 옥수수를 심어 가꾸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는 자연생태계 앞장지킴이로 국가에서 선정된 학교였습니다. 때문에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 활동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를 발전시켜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자연지킴이 활동을 적극 독려하며 우수 학교를 매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학교는 다시 이를 자연환경을 가꾸는 데 재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시윤(건양대 경찰행정학) : 저 역시 자연과 공존하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카페에서는 단골 고객들에게 커피 씨앗을 심어주고 다 자라면 집으로 가져가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단위의 사업체에서도 충분히 자연과의 공존을 실천할 수 있고 이처럼 일상에서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소희(건양대 경찰행정학) :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분야 중 하나가 농업인데요, 즉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파괴와 오염이 다시 농업에 대한 피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켜 농촌에서 각 지역 특산품으로 체험학교를 운영시키는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즉 어린이, 어른 가릴 것 없이 직접 농산품이 자연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체험하고 이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도울 것입니다. 이로써 농촌의 발전과 더불어 자연에 대한 인식제고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연(건양대 경찰행정학): 저는 국소희 학우와 반대로 도시에서의 자연과의 공존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대전에서는 일명 '도안 호수공원'으로 불리는 생태호수공원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완충 녹지대가 조성될 예정이며 동시에 주택과 학교 및 유치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공원의 조성은 단기간에 이윤을 창출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김시윤(건양대 경찰행정학) : 공감합니다. 도시의 공원 조성은 열섬현상을 막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의 공원은 도시의 5 분의 1 의 면적을 차지하는

크기입니다. 이제는 자연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거나 뒤로 밀어놓아서는 안 되고 경제정책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휴식공간으로서 기능하는 자연

유현주(건양대 국방공무원학) : 저 역시 자연이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입원 환자가 많은 큰 병원에는 쉼터가 중요한데 이 곳을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환자들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늘어나 이윤을 창출하는 것처럼 국가차원에서 대도시의 공원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제주도의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등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처럼 자연을 보존함으로써 국가의 품격이 높아지고 관광자원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다솜(건양대 국방공무원학) : 건양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어떻게 자연과 공존하며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우선 자연과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연에 대한 인식을 위한 교육이 학교차원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제도적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이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교육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운영하는 학교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시, 도 단위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상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체에서도 자연과의 공존을 실천해야 합니다. 농촌에서의 자연체험 학교의 운영과 도시에서의 생태공원의 조성으로 산업과 자연의 공존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보존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⑦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덕규 (경희대 프랑스어학 1): 안녕하십니까?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단기간에 급성장한 사례로 손꼽히는데요, 바로 국가 주도의 기업 중심적 경제가 그 동력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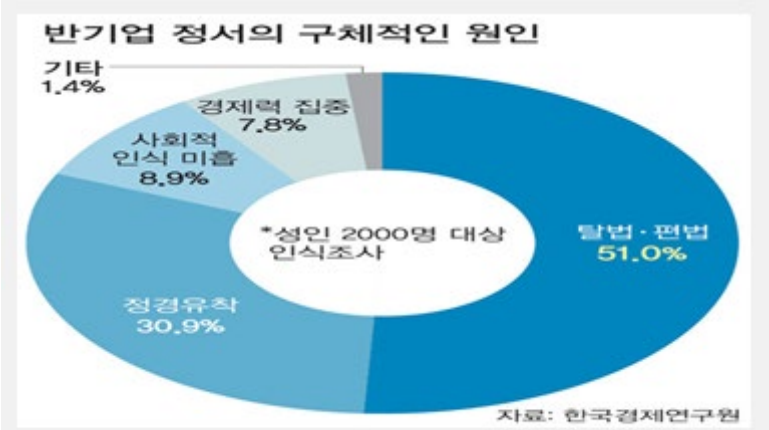
지난 50 여년 간 국가 경제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타격이 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반기업 정서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선 반기업 정서의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김도영 (경희대 원예생명공학 1): 우리나라 반기업 정서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액센추어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기업인은 한국의 경우 70%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기업호감지수 (CFI, Corporate Favorite Index)의 경우에도 약 50% 내외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절반이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기업 정서가 높은 편이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전체의 65%를 차지합니다.

조소영 (경희대 디지털콘텐츠학 3):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 경제에 가장 큰 공헌할 주체는 기업이다'는 항목에 대해 국민의 78%가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이윤을 창출하는 단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유독 높은 기준의 잣대로 기업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자료 2015) 반기업 정서의 원인: 탈법/편법, 정경 유착, 사회적 인식



인도네시아의 반부패기구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김덕규 (경희대 프랑스어학 1):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가 상당히 심각하군요. 그렇다면 왜 반기업 정서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영 (경희대 원예생명공학 1): 정경유착에서 오는 국민의 실망감이 반기업 정서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정치계와 경제계가 결탁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정치인 한 명이 여러 기업과 경제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심심찮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경유착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검찰을 정부 권력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라는 부패방지기구는 그 독립성과 엄격함으로 사회 청렴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재계의 고위층 인사에 대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며, 재판 과정에는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는 등 국가적으로 이 기구의 직원들에 대한 신변 보호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 기구의 수장을 뽑는 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최종의 1 명을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기구 직원이 부정을 저지를 경우 보다 엄격한 차원의 법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소재현 (경희대 기계공학 2):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고위층 인사를 수사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조심성을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 4 명은 기소유예로 처분되는 등 청렴의 모범이 되어야 할 기구의 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때문"이라도 검찰, 국세청, 감사원과 같은 국가 기관에 더 높은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암기식 입시 위주의 교육이 살아있는 경제 관념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조소영 (경희대 디지털콘텐츠학 3): 더불어 국민도 국가 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반기업 정서가 아니라 반재벌 정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업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기업을 운영하는 소수의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는 것입니다.

약 2 년 전 조현아 땅콩회항과 이를 대처하는 대한항공 일가의 모습, 영화 '베테랑'의 모델이었던 SK 최철원의 행실과 같은 특정 재벌의 행위에 대한 반감이 반기업 정서로 오인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업을 좋아하고 싫어하느냐는 전적으로 국민의 의지와 자유에 달렸지만, 부족한 판단력으로 반기업 정서를 키우고 이것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가 된다면 그 책임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행정 규제도 반기업 정서의 일종입니다.

소재현 (경희대 기계공학 2): 그렇습니다. 국민이 반재벌을 반기업 정서로 오인하는 상황이 공무원 사회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기업을 믿지를 않아 지나친 행정규제가 이루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업절차가 그 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절차는 총 12 단계로 뉴질랜드보다는 9 단계,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서도 5~7 단계나 많아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세계에서 창업절차가 가장 복잡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와 사업승인 등 2 단계만 거치면 창업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는 총 33 개 법률이 정하는 인 · 허가와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사업성을 따지는 것보다 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지경인데, 그럼에도 정부가 규제완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국민이 반대만 주장합니다.

따라서 현장 위주의 학습으로 경제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업은 지나치게 이론 위주로 진행됩니다.

물론 모든 과목이 그러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진학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경제 이론만 공부하니 실생활에서 반기업 정서가 만연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탁상공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경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도영 (경희대 원예생명공학 1): 또한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이 극대화될 때 반기업 정서가 완화될 것입니다.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Michael Porter 교수는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과 사회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생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CSV 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정무역을 예로 든다면 CSR 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거리가 먼 접근입니다. 개도국 농부들의 수익 보장을 위해 10% 정도 더 비싸게 구매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현지 농부들의 삶이 변화할까요?

스위스의 다국적 식품 기업 Nestlé 의 경우 코코아와 우유 생산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현지 농부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로 인해 현지 농부들의 수입이 300% 가량 증가하였고 Nestlé 도 양질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연탄 나르기와 같은 CSR 에서 벗어나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관된 사회적 기여, CSV 가 이루어진다면 기업과 사회가 모두 이익을 보면서 국민도 기업에 더 친근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반기업 정서가 보다 쉽게 완화될 것입니다.

김덕규 (경희대 프랑스어학 1): 소중한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반기업 정서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해를 끼쳐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만, 정서적인 부분이라 모호하게 느껴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언을 통해 권력 기구와 교육 제도의 개편, 공유가치 창출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⑧ 한성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박상희(한성대 무역 3): 안녕하십니까.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고도의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갈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기업은 CSV(creating shared value), 즉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공유가치창출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가 높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사회공헌 지출을 많이 했음에도 반기업정서 때문에 공유가치창출이 방해가 되거나 오히려 반기업정서 때문에 CSV 을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를 각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반기업정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우(한양대 신공 2):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라 반기업정서도 심화되었습니다. 즉, 대기업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했으며 오늘날의 대기업은 과거 정부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및 자금, 노동 등을 공급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갈수록 규모가 더 커지고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국민정서와 정부의 규율을 넘어선 탈법과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은 반기업정서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극복해야 합니다.

안정민(고려대 사학 2): 하지만 반기업정서는 전체기업을 일반화하거나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반기업정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오히려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기업정서는 대부분 실상 재벌기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재벌정서로 불려야 합니다. 최근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사건, 모 재벌가의 폭행사건, 마약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키고 약한 처벌을 받거나 받아도 풀려나는 등의 미약한 법과 체벌이 국민들에게 재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합니다.

박세윤(서울대 국문 1): 물론 대기업 재벌들의 행실과 갑질에 대한 논란으로 반기업 정서를 불지필 수도 있지만 기업 간의 비합리적이고 불법적 행위가 반기업 정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당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독과점 기업의 담합 등 자본과 권력구조의 힘에 의한 정당하지 않는 행위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대기업의 단순한 이익추구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투하여 자영업자의 상권을 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승(건국대 경영 3): 다들 반기업 정서가 기업의 비합리적 행위에 따른 국민의 필연적인 정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 보았을 때 반기업정서가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롯데기업일가가 국적 및 정체성 논란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분쟁 논란이 국수주의의 감정적 대응으로 바뀌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방해 요소입니다.

대기업도 우리나라 GDP 전체 생산량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게 됩니다. 경제적측면에서 국적을 따지는 일은 무역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서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반기업정서는 부가가치측면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투명경영을 통해 신뢰를 주는 것은 반기업정서의 극복에서 가장 중요하다.

박상희(한성대 무역 3): 각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반기업정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기업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종태(경희대 무역 2): 기업은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반기업정서를 극복해야 합니다. 경영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한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각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주영(중앙대 경영 3):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독과점 기업의 담합, 부당내부거래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몇 년 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구멍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23 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제 1 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23 조의 2 제 2 항에서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완성, 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이 사익편취의 또 다른 구실을 만들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의 행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들회사가 어머니 회사로 일감 12 억 원을 몰아줬음에도, 계열사 간 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정예슬(숭실대 경영 3): 저도 위 학우의 말에 공감합니다. 법의 잣대가 엄격하게 판단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치가 확립되어야 반기업정서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예전보다는 현실에서 적다고는 하나, 여전히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생계형 전과자는 식당에서 라면 10 개를 훔치고 징역 3 년 6 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또다른 재벌기업의 총수는 회삿돈 497 억원을 횡령하고 징역 4 년을 받고 약 1800 회의 황제면회와 특별사면으로 2 년 7 개월의 징역을 보냈습니다. 이 대비되는 두 법의 심판은 공정한 판단이 였는가에 대해 국민이라면 의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돈, 위세, 특권이 아닌 법 앞에서 누구나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윤리적으로 엄격한 잣대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민정(성균관대 글경 2): 위 학우의 말처럼 법의 잣대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별사면'이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사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와대의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내지 가석방에 대해 철처히 국민에 정서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정경유착과 재벌에 대한 특혜를 지양해야 합니다. 비자금사건, 뇌물사건, 각종 정치헌금과 관련하여 감시하는 일은 공무원이 주축으로 감시하겠지만 공무원 외에도 일반사람들이 의심이가면 익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철처한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안종태(경희대 무역 2): 기업에 대한 감시의 기능은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순기능을 다할 수 있는데요. 주주총회를 통해 소액주주부터 대주주까지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반기업정서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 삼성물산이 엘리엇 측의 소송제기와 주주총회의 반대 공격에 의해 경영권 방어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애국적인 마케팅을 통해 삼성물산은 호소했으나 실질적으로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마케팅이였는지 의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애국심보다는 투명한 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신뢰를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투명한 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주주들과 피드백을 통해 경영개선에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경영권문제뿐만 아니라 반기업정서까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민(고려대 사학 2): 요즈음 실업문제가 심각한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고용확대를 한다면 반기업정서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실업문제를 반기업정서를 극복하는데에 전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CSR, 공유가치창출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업이 참여한다면 사회적 문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상희(한성대 무역 3): 반기업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과 재벌기업에 대한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주들의 피드백을 평소에 고려하고 경제주체들이 공공선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기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기업은 비리나 부당거래를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중요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반기업정서로 인한 감정적인 논쟁 때문에 자칫 현상의 이성적인 판단을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에 참여해주신 학우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⑨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성찰형 인간으로의 성장을 위한 교육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개최되었다

송지나 (동아대 경영 3): 현재 메르스사태, 독도등의 역사왜곡 문제, 하시마섬 유네스코 등재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부실한 계획력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가 이미 발생해 이슈화가 되었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일관하고 있어 국격을 심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만을 쫓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계획력, 끈기로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 나가야 할 텐데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진정한 해결방법은 교육의 선진화일 것입니다. 이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교육의 선진화, 성찰형 인간으로의 성장을 위한 교육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승현(울과대 간호 4): 저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위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주입식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이루어진 주입식 교육의 영향으로 우리 국민들은 답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정답을 맞추려는 습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적 문제에서 정답이라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답을 뜻합니다.

정답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린 상황속에서는 정작 자신이 제시한 '정답'에 대해서 스스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송지나(동아대 경영 3): 그렇다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행되어야 할까요?

이보람 (울과대 유아교육 1): 저도 이승현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답을 맞추는 문제가 아닌 답이 없는 문제를 탐구하는 형식이 과제 또는 시험 출제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다음 보기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와 같은 문제 대신 '~의 해결방안은?' 또는 '~에 대해 조사해보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직접 그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세요' 와 같은 형식이어야 합니다.

보기 중 맞는 것을 잘 골라낸다고 그 보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이 관심으로 이어져 자연스레 진로선택과 적재적소의 인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겐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도덕,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유기적으로 실행될 때 더 나아가 시민의식이나 준법의식 및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며 사회문제에 대해 진정 공감하는 마음이 바탕이 될 때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이 바탕이 될 때 장기적인 안목이 형성될 수 있다

송지나 (동아대 경영 3):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안이 잘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할까요?

최소연 (계명대 통계 4): 현재의 공부 목적은 시험용 공부, 즉 대학입학을 위한 수단적 가치가 더 큰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주입식 교육의 탈피를 위해 여러 교육방식을 진행해도 현재의 입시제도와 학벌중심사회 아래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적으로 스스로 성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최우선적으로 대학입학을 목표로 두는 잘못된 방향으로 과도하게 과열되어 있는 교육열로 인한 학력인플레이션, 학생들의 진로고민 기회박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입학사정관제 등의 제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근본적,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로 자신의 꿈을 찾는다 할지라도 고등학교 진학 후 현 입시제도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 꿈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확률도 작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는 성적보다 자신의 꿈에 대한 관심과 재능에 기준을 두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등학생에게마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대학의 과를 정해 거기에 맞는 맞춤형 스펙을 쌓는 등의 변질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학벌과 스펙으로 점철된 현 취업 현실만 보더라도 현재의 고등학생들에게 성찰형의 교육방식이 잘 뿌리내릴리는 만무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인재상이 점수 높은 사람에서 성찰형 인재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대학교의 입학 전형이 단순히 등급만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좀더 세밀하고 진화된 입학사정관제 또는 토론 및 심층면접 등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 및 재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양적평가방식을 질적평가방식으로 바꾸고 현재 취업시장에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탈스펙' 형식을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 및 성장시킨다면 사회전체적인 분위기 변화로

인해 위 학우들의 방안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장기적 안목 바탕의 문제 접근, 계획력, 실천력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송지나(동아대 경영 3): 장기적인 안목과 꾸준한 끈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일단 정답을 맞추려는 습성을 없애기 위해 답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답이 없는 문제를 활용한 과제 및 시험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는 고민이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시민의식이나 준법의식 및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이 안목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사회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질적평가방식의 확산, 취업제도 및 입학제도 개선 등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점수, 학벌위주의 인재상으로부터 성찰형 인재로의 사회적분위기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산지역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용지수 (언론 3) :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 월 30 일, (재)한국선진화포럼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Ⅱ)에서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 년 간 선진화운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긍정적인 인식을 사회에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1 인당 국민소득은 3 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의 성공 경험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맞물려 계층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이상형 선진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생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상형 선진화 모델, 즉 '착한 선진화'의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경제와 정신문화 융합 선진화 방안', 다른 말로 '착한 소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합니다. 모두가 '브랜드' 제품만을 찾습니다. 넓은 집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전부가 되어, 국민 전반의 '행복의 기준'이 획일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소비를 통한 만족 추구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는 절제된 소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잘못된 소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에 선진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한 소비'의 방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주하 (언론 3) : 저는 유아기부터 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지표를 설정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는 소비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과 비교해 더 좋은 물건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꼭 필요한 물건만을 구매하도록 해 분명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가정에서는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지출에 대한 확실한 관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대다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소비를 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용돈기입장, 경제일기장 등을 쓰고, 초등 교육 과정에서도 경제

기초상식을 추가해 아이들이 경제를 어렵지 않게 느끼고 소비, 저축 관리에 어린 시절부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지수 (언론 3) : 경제와 소비 관념에 대해 유아기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신 이주하 학우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저도 유아기 때에 경제 교육을 제대로 받은 기억이 없어, 아직도 경제 용어나 소비, 지출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더욱 공감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종현 학우는 '착한소비의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현 (언론 3) :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소비문화를 이룩한 여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해왔습니다. 유럽의 경우, 국민 대부분이 물건을 아껴 쓰고, 바꿔 쓰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유행이 지났다고 새 옷이나 다름없는 옷을 장롱에서 썩히다 한꺼번에 쓰레기통으로 쏟아버리는 우리네 소비행태와는 대조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낡은 것에서 향기를 느끼는 기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70~80 년, 심지어 1 백 년도 더 된 고가구를 자랑스럽게 쓴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래된 것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쳐서 오래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의류, 잡화 분야의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물건을 '오래 쓰려고' 하기 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 '비슷한 물건이 있는데도 새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나바다(아껴 쓰기, 나눠 쓰기, 바꿔 쓰기, 다시쓰기)' 운동과는 사뭇 다른 의도입니다.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의류, 잡화류보다는 사용기한이 긴 가구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래된 것을 조금 수선, 수리해 새것처럼 사용하는 '리폼' 문화를 유행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지수 (언론 3) : 원종현 학우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실제로 유럽 가정을 방문해 보면 3~4 대를 내려쓰는 가구나 물품이 즐비합니다. 1 백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칼과 포크, 때 묻은 인형, 흠집 난 찻잔 등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오래된 물품들은 그 자체로 아껴 쓰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손들에게 훌륭한 교육이 된다는 점에서 인상깊더군요.

어려서부터 전통을 소중히 하고 오래된 가구, 물건들을 아끼며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중고물품을 함부로 버리거나 새것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배운 이런 정신은 건강한 소비문화의 근간이자 오늘의 프랑스를 선진국으로 지탱해주는 원천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휘 학우는 '착한 소비의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김진휘 (언론 3) : 저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제품 연구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확립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네임밸류' 만들기는 소비자들을 줄 세우고, 기업이 '갑'이 되어 행복과 경제력의 기준을 '비싼 제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유무로 판단하게 합니다. 기업의 이러한 태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지수 (언론 3) : 맞습니다. 절약정신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소비문화가 확립된 선진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지역 밀착형 대형 소비 센터인 '막스 앤 스펜서'는 전국 곳곳 주요 도시에 자리 잡고, 중저가 상품을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젖줄' 역할을 합니다. 이 업체 상품의 특징은 브랜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류에서부터 구두, 학용품, 스포츠용품, 주방용품 등을 두루 갖췄으나 어느 품목도 자신의 '출신'을 과시하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철저한 실용정신을 담아 브랜드 값과 광고 선전비 등의 거품을 줄여 합리적인 가격을 창출한 매장인 것입니다.

김진휘 (언론 3) : 좋은 예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우리 국민들이 '물리적인 소비'는 줄이고 '정신, 문화에 대한 소비'는 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경제력의 우위를 '비싼 물건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독서, 공연, 전시 문화, 여행 등을 얼마나 많이 즐기냐'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명품 브랜드만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독서, 공연, 전시 등 정신적인 가치를 함양하는 데에 소비와 지출을 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겉을 치장하기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데에 더 집중하는 소비문화를 창달하는 것도 '착한 소비'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지수 (언론 3) : 정신, 문화적 가치를 함양하는 데에 소비와 지출을 늘여야 한다고 발의 해주신 김진휘 학우 감사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우리나라의 소비 문화를 개선하려면 국민 전반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절약과 저금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무분별한 소비 행태와 명품 브랜드만을 쫓는 분위기도 타파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가격대가 높은 명품 제품들에 다량의 소비세를 붙이고, 유아기부터 올바른 소비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중고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와 같은 '벼룩시장' 이벤트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의 절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나바다 운동을 개최하고 중고 마켓을 여는 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매김 시켜, 문화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저학년 때 학생들에게 저금 통장을 만들게 해, 이를 고학년이 되어 졸업을 할 때까지 유지시켜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모아보게 하는 것도 좋은 경제, 절약, 소비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유아기 경제 교육, 아나바다 운동, 기업의 명품 이미지 구축만을 위한 노력을 타파하는 것, 정신, 문화적 소비 늘이기 또한 착한 소비에 톡톡히 일조하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⑪ 용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장대혁 (용인대 2):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들의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10 월 30 일, 한국선진화포럼 창립 기념 두 번째 10 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의 토론회를 통해 저는 선진 인재 등용이라는 정책 제안을 해보았는데요. 이 주제를 구체화하여 '각 기업과 대학에서 선진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애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선진 인재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리더십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한 좋은 인성을 가진 인재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면서 패널 별로 의견을 들으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조서경 (성균관대 4): 저는 선진 인재 등용 제도에 대해 찬성합니다. 먼저, 대학은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여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명문대를 나왔음에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지식적인 부분 이외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게 선진 인재의 덕목인 올바른 정치, 경제, 사회적 가치관과 리더십과 인성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인재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손하경(고려대 3): 저 역시 찬성쪽인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학우 말에 덧붙이자면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수준으로는 기업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이 때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가진 선진 인재라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송주(아주대 3): 앞에 말씀해주신 학우 분들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만 오히려 사교육 조장과 취준생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안겨주기에 역기능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선진 인재가 주는 모호성 또한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최아영(중앙대 3): 맞는 말입니다. 저 또한 모호한 선진 인재라는 기준이 오히려 기득권층들의 자녀들을 뽑거나 하는 등의 현대판 음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해용(아주대 3): 반대분들의 의견에는 의문점이 몇 가지 드는데요. 사교육 조장의 경우는 일부의 인재를 뽑는 전형으로만 도입이기에 이 작은 파이를 위해 사교육이 조장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일부 생길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허송주(아주대 3): 입학사정관 제도의 경우 일부 사교육 수단이 생김으로써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만들어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선진 인재 등용 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진인재들을 등용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선진 대한민국은 가능합니다.

조서경(성균관대 4): 모호성이라는 부분은 발제자분이 전체적인 틀을 잡았으니 세부적인 지침과 방안을 정한다면 악용될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절차가 없어서 그렇지 이를 확실히 해둔다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장대혁 (용인대 2): 네, 오늘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의 주제는 착한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과 기업에서 선진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의 도입 여부였는데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선진 인재들이 대학과 기업에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낳을 거라는 기대를 하셨고 반대 측에서는 사교육 조장과 제도의 악용 여부 등을 걱정하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이 아니기에 우려에 대한 부분 등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시해준 의견들을 바탕으로 개선을 통해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⑫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제3차 선진화연구모임이 진행되었다.

조준상 (경영 3):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 1,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0 월 30 일, (재)한국선진화포럼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Ⅱ)에서는 국민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날 다양한 전문가 분들의 발표와 토론에서는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의 방안으로 크게 1) 경제와 정신·문화의 융합, 2) 공유가치 창출, 3) 기술의 개선을 통한 자연과의 공존, 4) 시민역량 개발교육과 실천운동의 전개의 4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착한 선진화의 방안으로 공유가치 창출이 필요하다.

조준상 (경영 3): 저는 4 가지의 방안 중에서도 공유가치 창출 전략에 특히 관심이 갔는데요.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적 개선과 착한 선진화를 추구하는 공유가치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구체적인 공유가치 창출 전략에 대해 학우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3 대 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가 각각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인은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공동협력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효과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공유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학우 분들의 다른 의견이나 추가로 덧붙이실 의견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인, 기업, 정부가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장훈 (경영 3): 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공동협력모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대기업 위주의 급속한 경제성장 덕분에 지금의 경제 수준을 이루었지만, 대기업과 함께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중소기업들은 많이 미약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각 분야의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강소기업인 '히든 챔피언'을 다수 보유한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유주열 (경영 3):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 기업들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핵심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해온 대기업들이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기술 협력 및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앞장섰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기피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에 있어 중소기업 근무 경력을 적극 인정해주는 것도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히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정범규 (경영 3): 기업들과 더불어 개인들도 양보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금피크제인데요. 지금까지의 연공급을 기반으로 한 임금체계는 해마다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과거의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성장이 이전과 달리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와 달리 바뀐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의 중국, 베트남과 고기술의 일본 사이에 끼여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유진 (경영 3): 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조금 유연한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무조건 임금을 깎고,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성장하고 더 큰 과실을 얻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대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수 (경영 3) : 다른 분들이 기업과 개인의 입장에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정부가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수행했으면 합니다. 과거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정책이나 법률이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를 과감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시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정부가 일관성 있게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준상 (경영 3): 네, 오늘 서울시립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의 방안으로 구체적인 공유가치 창출 전략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모든 학우 분들이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참신한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은 노사관계에 양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노동의 생산성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수용해야 하며, 기업은 '히든 챔피언'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기술 협력 및 투자를 하면서, 중소기업 근무 경력 인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경제정책에 있어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정책이나 법률을 과감하게 개정하고, 시장에서 혼란이 없게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공유가치 창출을 이루어내고,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⑬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최현수(예술 3):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서울지역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 월 30 일(화) 창립 10 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선진화의 방향 중 착한 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선진화 방안을 선정하고, 이에 착한 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사 파트너십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여러 노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인간존중을 통한 준법정신의 함양이 노사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사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제안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노동문화나 문제들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노동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사 파트너십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전담 교육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친구처럼 신뢰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오해를 풀고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담 교육팀을 정부에서 구성하여 파견한다면 노사파트너십을 강화시켜 착한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다른 추가할 의견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팀 운영을 통해 노사관계를 점검하고 개선하자

윤대일(예술 3) : 저는 최근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가 현재의 노동문제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리고 여러 조례 등 다양한 법들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협력적 노사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갈등과 파업,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둘만의 싸움으로 진행되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견팀을 운영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송화(예술 3) :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노동상황에서 여러 문제들이 회사측, 노동자측 모두에서 준법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최소의 기준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교육과 협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회사의 권리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김태환(카톨릭 교육 3) : 현재에도 지차제를 중심으로, 회사측의 요청으로 약간의 노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준법정신의 형성과 노사파트너십의 형성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파견과 교육 정책을 편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세은(예술 3) :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파견된 교육자들이 교육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회사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가 준법정신을 지키고 협력하는 것도 사내의 분위기 형성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주원(한국외대 3)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외부의 감시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 중요한 건 노사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내부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 노동자가 대립하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 상생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호진(국민대 3) : 내부적 변화라는 것도 외부적 감시나 개혁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노력하고 점검하는 것이 내부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사파트너십 전담 교육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회사들을 점검하고, 코치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현수(예술 3) : 많은 분들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정부의 교육, 코치팀을 만든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일 학우와 박송화 학우는 현재 노사간의 현실적 문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파업,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 둘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파견팀을 운영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반면 백세은 학우와 박주원 학우는 외부에서의 노력과 감시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의 분위기와 결속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학우들의 의견은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 감시 혹은 내부적 변화를 통해 기업내의 노사파트너십이 형성된다면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성장은 자본주의의 성장으로서 이어지고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생산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복지에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기업문화의 발전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가져오고, 이는 우리나라의 착한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에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진화 과제 10: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제 99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김다혜(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물질적 풍요로움 속 정신적 피폐함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루어 세계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10 위권에 속해 물질적인 풍요를 느끼고 있지만 그에 반해 정신적 피폐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만과 갈등이 넘쳐 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보상보다 상대적 보상을 중시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쉽게 절망합니다. 또한 저성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업, 빈곤과 맞물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사회적 갈등 지수는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사회갈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2013 년도 기준 246 조 ⇒ 즉 한 해 예산의 70%에 달합니다. 우리가 사회 갈등 비용만 줄여도 저성장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윤리력은 국부 증진의 기본 바탕

독일의 경제학자 Friedrich List 는 국부증진의 힘은 분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력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국민적 통합에 있고 윤리력이 국가의 부를 생산하는 기본요소라고 했습니다.

또한 Max Weber 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내뿜는 물신사상과 계층간의 갈등을 억제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정신력, 윤리력에 대해 강조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Lester Thurow 는 공평성의 인식이

효율성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계층이 공평하게 이윤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되고, 협력·팀워크 정신이 강화되어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방법은 예로부터 지혜와 슬기로 어려움을 극복한 선조들의 도덕 윤리정신, 인본주의에 기초한 홍익인간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서구적인 문물과 문화에만 치우쳐 우리의 훌륭한 정신문화유산과 전통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물질적 풍요는 이루어졌으나 정신적 피폐함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계층이 다 함께 가는 따뜻하고 착한 선진화

모든 계층이 함께 갈 수 있는 따뜻하고 착한 선진화를 바탕에 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문명과 정신적 풍요로움의 어울림,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공동체적 가치 추구,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공존, 남과 북이 함께 하고 지구촌 인류가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해결 방안입니다.

착한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오블레스 노블리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둘째, 가지지 못한 사람들 또한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타인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을 이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표를 얻는데만 몰두하지 말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갖고 착한 선진화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전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 발전된 현실에 맞게 적용

또한 대학생들은 동양고전 읽기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해 전통문화 속에 스며있는 공동체 정신과 선조들의 애국심을 본받아 발전된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봉사활동을 실천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착한 선진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밖으로는 나라에 충성하는 소양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한자 교육을 시키고 전통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을 실천해 간다면 따뜻하고 착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김덕규(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OECD국 선진화 순위

1위	스웨덴	84.3점
2위	덴마크	83.9점
3위	미국	83.0점
4위	핀란드	82.1점
5위	노르웨이	82.0점
9위	호주	80.4점
10위	캐나다	80.2점
⋮		⋮
24위	한국	65.5점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10 삼성경제연구소) 30개 국가들 중 2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물질적인 급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선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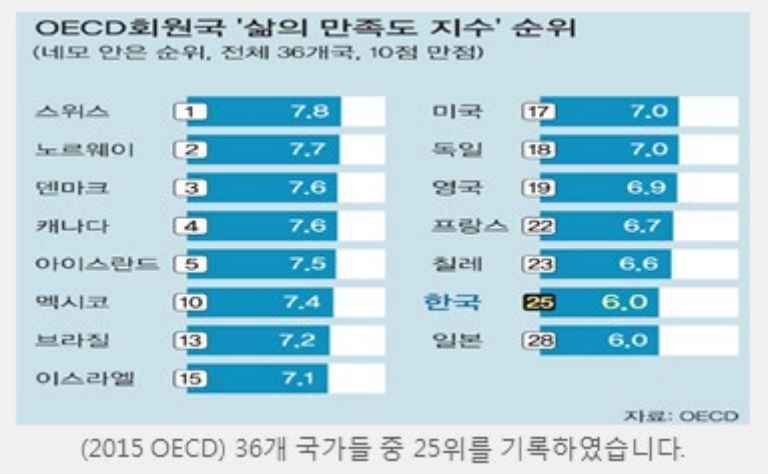
이 선진화 방향을 찾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 99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윤형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의 유대가 상당히 낮고, 사회갈등 중 계층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전통윤리의 회복, 착한 선진화 운동 전개 등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토론자인 김경동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며, 성숙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동의하며 도덕, 공감, 절제, 문화적 선진화롤 통해 착한 선진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Emanuel Pastreich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인본주의와 전통적 가치관의 회복을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는 바로 정신문화의 성숙입니다. 물질문화의 번영을 추구하면서도 이제는 정신문화의 상대적 빈곤을 완화하고 공동체적 유대를 쌓아야 한다는 김윤형 교수의 주장은 한국 사회의 선진화 방향과 일맥상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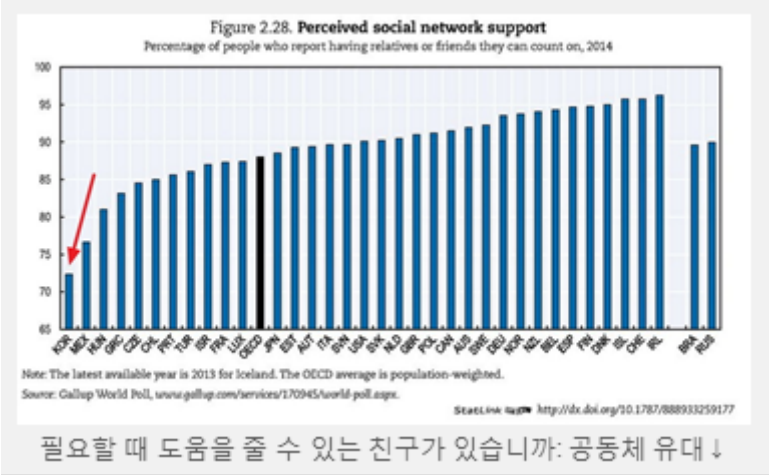


(2015 OECD) 36개 국가들 중 2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모습은 정신문화적 관점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개인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는 OECD 34 개 회원국과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36 개국 중 25 위를 기록한 것이지요.

또한 올해 유엔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춰 갤럽이 실시한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은 143 개국 중 118 위를 기록했습니다. 2013 년 94 위에서 크게 내려간 것인데요, 우울사회의 전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는 타인과의 유대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수백 명의 연락처를 갖고 있으면서도 툭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지인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요?



그래서 주목해야 할 통계는 공동체 유대 부분입니다. 공동체가 약해지고 개인이 파편화된다는 자료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인들은 72%만 긍정적인 응답을 해서 OECD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1 년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50 세 이상에서는 60.9%로 떨어졌으며, 초등학교 졸업 학력자에서는 53.0%까지 추락하면서 OECD 에서 학력에 따른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분류됩니다.

원인은 지나친 경쟁, 그리고 일과 여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적인 신뢰가 사라지고 과거와 같은 공동체 문화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각자 먹고살기 바쁜 경쟁사회에서 내 이웃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현실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경쟁은 왜 생길까요? 바로 일방향적 성공 공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대학도 스카이, 취업도 대기업, 문과는 법조인, 이과는 의사라는 각 분야별 뚜렷한 성공 사다리가 존재합니다. 모두가 하나만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쟁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의 느낌보다는 사회적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 많고 전문화된 전문학교를 세우고 지원해야 합니다. 일방향적 성공 공식을 깨뜨리고 한국 사회가 여러 개의 사다리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지원이 이 사다리에 대한 좋은 사회적 인식을 꽃피우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과 여가의 이상적 균형점을 세우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 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 제도를 기획, 실행해야 합니다. 좋은 인증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노력을 촉구해야 합니다. 공무원 집단의 경우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기 용이하지만, 문제가 되는 분야는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의 조직 문화를 쉽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사원들은 위의 눈치를 살피고, 또 많은 일거리로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며, 회식이 잦은 경우 여가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일과 여가의 이상적 균형점을 세우고 일 년에 4 번씩 직원들의 설문 응답을 통해 각 회사의 실정을 파악하고 인증 제도를 적용하면 문제가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좋은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그 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으로 더 노력하게 됩니다. 나쁜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지요.

선진국들이 여가 시간이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독일인들은 10 년 전에 비해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데요,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6 시간 30 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유 시간에 스포츠 또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TV 또는 라디오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적습니다.



El Sistema도 공동체 회복의 일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정부는 여가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체와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 데에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아동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예술강사 지원, 복지시설과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예술교육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등 많은 정책이 있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사회가 불안정한 베네수엘라의 범죄아 가난이 가득한 카리카스 동네에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자는 믿음에서 시작한 엘 시스테마는 유명한 음악 교육 모델입니다.

음악으로 수십 만 명의 사람들에게 인성 형성, 지성과 감수성을 계발시키고 그들을 세상의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구해낸 교육입니다. 음악 뿐 아니라, 여가 생활이 지역적으로 활성화되면, 다시 말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 경쟁사회, 피로사회, 공동체 유대 파괴라는 한국 사회의 오명을 벗을 뿐 아니라 지역 문화까지 선도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정책 홍보는 지역 정부가 지역에 맞게 홍보하여 공동체가 여가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왕래가 잦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힐링'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가수 로이킴의 '힐링이 필요해'부터 관광 상품 '힐링로드', '힐링 명상', '힐링 음식', 방송 '힐링캠프' 등 힐링이라는 단어도 마케팅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힐링이 모두 일시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을 위로할 수는 있어도 해답이 될 수는 없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로가 아니라 치유에 있습니다. 전문학교 활성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여가시간과 행복 인증제도, 지역의 여가 정책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공동체 유대를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③ 류호영(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오지랖 보다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떤 것 같나요? 우리 주변의 지인들은 서로 의지가 되고 있나요? OECD 는 이 질문과 관련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합니다. 올해 10 월에 공개된 OECD 의 "2015 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는 10 점 만점에서 **5.8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연계지원 부문에서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꼴지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연계지원이란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할만한 친구나 친척 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공동체 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우리끼리'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공동체 의식이 약하다는 결과는 다소 특이하게 여겨집니다.

흔히들 한국인들은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 서로에 대한 ‘참견’이나 ‘오지랖’이 심하다고들 합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대학 가야지!", "결혼 언제 할 거냐?", "애는 아직 소식 없어?", "집은?"라는 등 걱정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곤 하니까요.

그럼에도 OECD 보고서의 낮은 공동체 의식 점수가 보여주듯, 우리가 정작 어려울 때는 나서주는 이웃을 하나 찾기도 어렵다는 사실이 참 역설적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집집마다 한 숟가락의 쌀을 모아 만든 ‘좀도리쌀’을 불우한 이웃에게 베풀어 줄 정도로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고속 성장한 여파 때문인지, 공동체 의식의 촛불은 어느새 차갑게 꺼져버린 듯 합니다. 저성장 속에서 사회갈등이 보다 심각해졌고, 개인이기주의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한국사회를 변화시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 의식’을 되살려야만 합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한국의 정신'이 필요하다

기업이 비전과 경영이념을 정립하여 사업을 이어 나가듯, 나라 운영에도 통치이념이나 철학이 필요합니다. 고조선에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삼국~고려시대에는 불교, 조선 왕조 때는 유교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교, 화랑도, 풍수지리학 등이 중요한 이념으로서 인간 본심과 정신을 키워주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김윤형 교수(한국외대, 미국 동서문화센터 수석연구위원)는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은 역사적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현실에 적합한 이념이나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능히 제 것으로 소화하였으며, 또 그를 발전시켜 한국만의 훌륭하고도 독창적인 정신문화로 재탄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은 전 세계를 부유하고도 자유롭게 만든 '자본주의·시장경제·민주주의'를 쉽게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소화불량에 걸려 사회갈등이 끊이질 않고 행복지수는 추락하고, 최근에는 '헬조선' 키워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든든히 쌓아온 정신문화적 토양은 이미 와르르 무너져버렸습니다. 사회 공통의 가치관이 부재하면서 우리 영혼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새로운 한국의 정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 '한국식 탈무드'가 그 해법이다.

그 새로운 정신은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아주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쌓아온 '옛정신'입니다. 지금은 옛것이 다 무너져버렸지만, 다시 살펴보고 새롭게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 정신의 핵심인 홍익인간, 불교의 자비, 유교의 충·효·인, 자연과 인간의 조화 등 너무나도 훌륭한 정신들이 산재해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의 박애·평등주의까지 수용하여 정신문화적 토양을 완전히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해당 전문가와 학자, 교육자들이 한데 모여 우리의 옛정신에 기반한 '새로운 정신'을 다시 쌓아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에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선 반드시 '책'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단 한 권의 책이 있었기에, 20 억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탈무드'라는 책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잘 정도로 어릴 때부터 달달 읽었기에 우수한 민족으로 꼽힐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받아 우리 한국에도, 한국만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철학서처럼 인생과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고, 종교서적처럼 믿음과 위안을 주고, 자기계발 서적처럼 깨우침과 발전까지 가져다주는 그런 책 말입니다.

탈무드를 읽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유대인들은 사회발전에 일조하고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훌륭한 시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한국식 탈무드'와 함께 한다면, 꺼져버린 공동체 의식의 촛불을 다시 밝히고, 대한민국에 '착한 선진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윤수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근 따뜻한 이웃과 공동체 문화를 그린 '응답하라 1988'이 유행이다.

최근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단순히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이 나와서가 아닙니다. 80 년대, 겨우 빈곤을 벗어나 이제 막 경제성장 궤도에 올랐던 대한민국의 그때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난했어도 이웃과의 왕래와 온정이 살아 있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그런 따뜻한 모습을 현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그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들 중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항상 하위권을 기록하는 반면 사회갈등

부문에서는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 년과 2010 년 지표를 두고 비교해보면 개선되는 여지가 하나 없이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세대와 지역 간의 계층 갈등 역시 심각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지요. 응답하라 1988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었던 친척과 친구들, 특히 이웃들의 존재가 현 대한민국 속에서는 부재합니다. 사회 갈등 봉합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계층 갈등과 분열은 곧 큰 갈등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분열 양상은 곧 대한민국 사회에 크나큰 갈등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7~8%의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던 과거와 달리 2~3% 수준에도 미처 도달하지 못하는 저성장 기조,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 위기와 맞물려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10 년대 연평균 3.3%, 2020 년대 2.7%, 2030 년대 1.9%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의 수치 또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요즘 이는 심각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속 가능한 선진화 패러다임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 풍요만이 아닌 정신적 풍요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선진화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전 생산력 증대에만 집중하던 고도성장 단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분배정의에 주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단순히 효율성의 잣대로만 사회적 공평성과 조화를 이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걸맞는 새로운 윤리적 가치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고도로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17 세기의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윤리적 가치판단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해왔습니다.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는 국민적 생산력이 분업뿐만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통해 증대된다고 보았지요.

유명한 사상가 막스베버 역시 청교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관이야말로 자본주의 경제성장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황금만능주의와 계층갈등의 폐해를 해소해주는 탁월한 기제였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한국인의 국민적 기질에 맞는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한국 전통정신의 정수들 중에서 사회 갈등 봉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윤리관들을 뽑아 내 대한민국에 수혈할 수 있는 '21 세기 신 르네상스운동'이 필요한 셈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의 수혈로 착한선진화를 위한 윤리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한민족의 전통적 정신문화적 풍토를 이뤄 온 핵심적 요소가 인도주의, 평등주의, 무엇보다도 공동체적 이념이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조선부터 이어져 내려온 풍수지리설 속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민의 모습, 홍익인간과 한국 불교 속 화쟁사상 등이 가진 자비, 윤리, 평등사상의 결합, 인본주의와 인의예지신의 윤리관을 가미한 유교까지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독자적인 종교적 교육 사상을 통해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고 한국 사회의 갈등을 치유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전통 윤리가 스며든 새로운 '착한 선진화'를 구축하고 공동체 문화의 피를 한국 사회에 수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5~60 년대부터 이어진 경도된 경제제일주의의 폐해로 나타난 심각한 사회갈등 양상과 물질만능 주의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 한국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의 미래 가치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청년 세대가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가치관과 목표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전통적 윤리관에 대한 자발적 교육과 연구·스터디 모임을 활성화 해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고민과 대안들, 그리고 공동체주의 가치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SNS 를 통해 적극 전파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그리고 조화의 문화를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청년 세대의 착한 선진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야 말로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분배의 양극화 시대를 극복하고 21 세기 신(新) 한국형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사회 전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④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우리나라

인터넷을 보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헬조선은 지옥과 조선의 합성어로 우리나라가 지옥과 같다고 해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런 한심한 별명이 붙을만 합니다.

세계의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다문화 가정 문제 등 수많은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우리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버렸고 그 결과 매해 300 조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제적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모두를 적으로 여기는 그런 끔찍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살률 8 년 연속 세계 1 위라는 통계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보여줍니다.



부끄러운 자살률 세계 1위

우리나라의 이 불행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 공동체의식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되살려야 합니다.

공동체의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절된 전통문화와 우리를 다시 이어야 합니다.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등 아름다운 덕목들이 지켜지던 조선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두레와 품앗이로 이웃과 함께 힘을 합치고 서로 도우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끈끈한 유대감을 키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애정과 유대감은 애국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조선말 등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벌떼같이 일어난 의병들이 이를 보여줍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의병들

외국인들이 기록한 100 년 전 개화기 때 조선의 모습도 지금과 너무나 다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따르는 효(孝) 문화, 가난하더라도 손님 대접을 융숭히 하는 문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모아 도와주는 십시일반 문화 등 훌륭한 공동체의식이 외국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단절된 전통문화와 우리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우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필요합니다. 전통문화는 우리 역사의 산물이므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결과물인 전통문화도 제대로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세미나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같은 전통문화와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기관을 더 만들고 세미나를 많이 열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보를 창출하여 대중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문화 체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금도 농촌에는 도시와 다르게 우리의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힘들 때는 서로 돕고 기쁠 때는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이런 농촌문화를 체험하며 배워서 도시에도 전파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을 통해 전통문화와 우리를 다시 잇게 된다면 지금의 수많은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⑤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의 자랑스러운 정신, 공동체의식!

한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정신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필자 '공동체의식'을 꼽을 것입니다. 이전부터 조상들은 공동체의식에 기반하여 두레나 풍물놀이와 같은 문화를 형성해나갔는데요. 다함께 고생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 노래도 부르고 의식을 치렀던 조상의 모습에서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통적인 한국의 공동체의식이 무너지고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갈등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3%가 한국사회의 갈등양상이 '심각하다'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는 '경제적 양극화'와 '리더십 부재 및 정치적 불안감'이 꼽혔는데요.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빈부차이 확대가 49.3%, 사회지도층의 지나친 자기이익 추구가 46.4%, 정치적 불안 및 리더십 부재가 45.1%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공동체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이게도 응답자 다섯 명 중 네 명 이상이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양극화'와 '리더십 부재 및 정치적 불안감'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여 공동체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필자는 공감적 경쟁사회와 선비정신이 각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부자와 빈자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승리자와 패배자의 갈등과 같이 다양한 갈등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공감적 경쟁사회를 구축하여 승리를 위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경쟁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공감적 경쟁사회란 승리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경쟁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쟁지향 계층은 국가발전을 이끌되 경쟁제한 계층에게는 국가의 보호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하게 노력했더라도 언제든지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는 급변하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탓하며 내버려둔다면 과연 그 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이 생겨날까요? 승자도 언젠가 경쟁에서 밀려났을 때 그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승리자와 패배자의 차이를 제도를 통해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적 경쟁사회를 구축함으로서 '경제적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공동체의식을 살리는 첫 번째 길이 됩니다.

리더십 부재 및 정치적 불안감의 문제는 최근 지도자의 부정부패나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구성원들의 불만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고쳐져야 합니다. 필자는 바로 '선비정신'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비정신은 인간으로서 떳떳한 도리인 의리를 지키고, 그 신념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지조를 간직하는 정신입니다. 국민들을 다스리고 올바른 정치를 행해야 하는 정치인과 지도자에게 선비정신은 꼭 필요합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국가지도에 나서야 하며 자신의 공약을 지켜 신뢰를 쌓아야 하며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태도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도덕국가를 지향했던 조선시대 선비들로부터 내려져온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당시 중시되었던 가치들은 현대에 와서 그 중요도가 퇴색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도자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선비의 기본가치만 지키더라도 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 공동체의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상 다함께 고생을 이겨낼 수 있었던 조상들의 힘에는 공동체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도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갈등 없이 통합되어 위기를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요? 공감적 경쟁사회와 선비정신으로 조화로운 선진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선진화 과제 11: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란 무엇인가

(제 64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권혁규(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오늘날 한국의 정치란 미군 부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서, 그 중에서 깡통을 골라내어 양철을 만들구, 목재를 가려내서 소위 문화주택 마루를 깔구,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목축을 하자는거나 뭐가 달라요?…… 한국 정치의 광장에는 하수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똥, 오줌에 쓰레기만 더미로 쌓였어요.”

“이게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소비에트입니까?……인민이란 그들에게 양떼에 불과할 뿐입니다. 양들과 개들을 데리고 다니는 위대한 김일성 동무는 인민공화국의 수상이라? 하하하”

위의 글은 최인훈의 ‘광장/구운몽’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는 이처럼 이데올로기적 이분법에 익숙하여왔지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과 독재의 구도가 생겨났으며, 한진중공업의 85 크레인과 희망버스, 더 나아가 아이들의 급식 문제까지 보수냐 진보냐의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힘의 균형은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분단체제로 인한 반공의식으로 진보·좌파는 곧 반국가세력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지하에서밖에 설 곳이 없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건국 이래 보수는 항상 우위를 점한 셈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하죠? 대학가에서 자신을 보수를 지지한다고 말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젊은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위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새누리당에서조차 ‘보수’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겠다며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용어를 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것을 볼 때 단순히 세대 문제로 치부할 수준은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보수주의가 흔들리는 데에는 안철수 열풍과 나꼼수 현상 등 외부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낱 미풍에 불과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바람에 뿌리마저 흔들린 보수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하지요.

보수가 악이자, 입 밖에 내지 못할 부끄러운 존재가 된 지금의 상황은 보수도 보수를 모른 채 단지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며 그들의 참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속임수 복지에 속지 말라며 흘린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생애주기별 맞춤이라는 보기 좋은 옷을 입고 뻔뻔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그러하죠.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요, 대학 등록금의 절반은 차액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양극화의 원인을 기업에게로 돌리며, 자유시장경제를 외치지만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보수정신을 스스로 외면하여 정체성을 잃고 급기야 그것을 부정하는 보수들이 오늘날 보수의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수의 가치와 이념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잊고 있었던 보수주의의 정신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먼저 도덕성과 정당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보수란 현 체제와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보수라면 현 법규에 충실해야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 제 64 차 월례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성현 정치평론가가 주장한 도덕철학과 미덕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드 콤플렉스라는 특수한 사회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가 사람들로 외면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득권을 옹호하고 부패를 외면했으며 함께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의원이라면 마땅히 내보내는 것이 당연하며, 특히 분단이라는 아픔이 계속되는 이상 불법을 동원해 병역을 면제받은 정치인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선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특정 개인에 의해서도, 김용민 막말 파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후보 공천과정에서 도덕성이 가장 돋보였다는 점에 있었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다 민첩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응용하는 보수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보수 지식인들에게는 낡은 성리학자적 양반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국가관, 역사관 등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주제들을 다루어 온 탓에 바른말을 하면서도 일반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였지요.

진보·좌파의 경우 그 진정성이야 어찌됐건 여성문제, 장애인문제와 같은, 일반인들이 솔깃할 만한 주제를 공략하여 따뜻한 인간미로 포장돼 있습니다. 반면 보수들은 너무 느리고 둔한 나머지 정치 구호나 외치는 냉혈적 인상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화된 시대에 맞는 프로파간다 전략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홀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참여형 정치 시대에 걸맞게 정책집행에 앞서 소통하고, 충분한 홍보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나꼼수'를 비롯한 새로운 매체를 어린 아이들의 장난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있는 부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비난과 의혹을 내세워 대중을 현혹하는 그들의 수단을 따라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강규형 교수의 주장처럼 미국의 해리티지재단처럼 훌륭한 보수주의 싱크 탱크와 지원단체를 육성하여 오해와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수호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둬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세계 경제사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함정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보수의 정신과 결코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를 분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복지이나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도 복지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복지를 늘리고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갈증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쟁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시켜야만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힘든 길이더라도 옳은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 본연의 모습이라는 점을 보여야만 합니다.

2040 세대라 묶어서 대표성을 부여할 요인도, 트위터의 소리에 동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침묵하는 다수를 보지 않았습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잃어버린 신뢰를 찾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쇄신과 근본 가치의 추구가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② 김승현(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한국 정계가 그 어느 시기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 치러지는 시기이면서 최근 4.11 총선결과가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정권 심판론과 거대야당 저지의 프레임이 충돌한 이번 총선은 아직 한국사회에서 지역구도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총선 이후 통합민주당의 당권구성과 통합진보당의 선거비리로 인해 후 폭풍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 국가적으로 정치갈등구조가 이념갈등으로 변질되면서 때 아닌 '보수'와 '진보'의 가치 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의도적인 양비론을 통해 지지를 얻었던 시기의 상황과는 다른 본질을 띱니다.

이 같은 논의는 명확한 가치관을 확립한 사회구성원들간의 극렬한 충돌로 확장될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고 '진보'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날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념 세력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정도입니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그들과 같은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보수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문제는 일단 뒤로 하고 그들 국가 내 영향력을 따져본다면 의회 과반 1당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한국에선 스스로 '보수'라고 주장하는 정당이 18대 국회에서 의석을 무려 200석을 차지했다는 점도 그들의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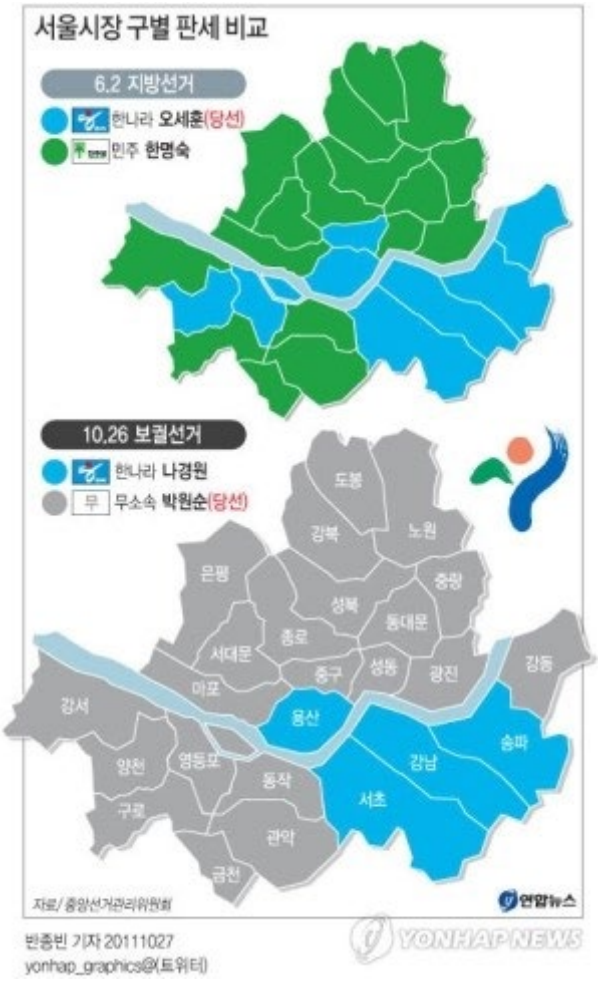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보수세력은 정통성 부재의 약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 여당에서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사실과 최근 심화되고 있는 현 보수 정권의 민간인 사찰관련 문제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은 국익추구보다는 사익추구를 우선으로 여기면서 보수적 이념가치 실현보다 소수 기득권층의 권력유지와 정경유착에 총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무리한 초법적 행동을 취하려다 보니 사회자본에 기반한 다양한 부정부패가 수시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국민 신뢰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는 탄압과 무시의 대상이었을 뿐, 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최근 나타난 몇몇 여당인사들의 청년층과의 대화시도는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방적 정보전달이 이뤄지고 대안 제시가 되지 않는 진정성 없는 형식적 통과의례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40대에서는 정치 민주화에 이은 경제민주화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은 민생관련 정책의 실패로 인한 비효율적 국정운영으로 40대에게 지지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범사회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보수세력을 사익추구 집단이라는 바라보는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것은 비단 몇 년 간의 행적에 대한 결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오늘날의 보수세력의 명백한 두 가지 사회갈등 프레임 조장은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목표도 알 수 없습니다.

첫째는 계층 간 대립구도의 형성입니다. 현 정부는 대부분의 임기 동안 '양극화'라는 단어를 필두에 내세워 양극화 담론을 주도해왔습니다. 양극화를 사회적 문제로 내세우고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18대 국회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보여온 신 자유주의 정책과는 모순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친이계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면서 '강남시장'이라 불렸던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의 등장은 서울이라는 작은 공간을 '강남과 비(非)강남'으로 양분하며 갈등을 부채질하였습니다. 오 전 시장은 새빛둥둥섬에 960여 억 원을 쏟아 붓는 등 서민의 삶과 무관한 전시행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비강남' 시민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의 결과는 2011년 서울특별시장 선거 결과를 통해 표면화됐고 얼마 전 4.11 총선에서 지역별 지지세력이 고착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극화'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 정책적 변화를 시도했던 것은 참여정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양극화 담론 주도가 복지정책의 실행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양성의 정책적 기획이었다면 오늘날의 양극화라는 요인은 적극적으로 정치도구화 되었으며 실제 투표가 양극화 프레임에 의해 조정된 것을 최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 정부와 여당의 행동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계층 간 대립구도와 이념 간 대립을 부채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세대 간 대립구도의 형성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세대 간 의견 대립이 발생했던 시기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물론 이러한 격차는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SNS매체의 다각화,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대 간 활용도의 차이가 현실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연하게 구분되는 정책 찬반여론과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차이의 원인은 역사적 경험에서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인데, 이와 같은 세대 간 구분 짓기는 독재시대를 경험했던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 간의 성격차이라고 볼 수 있고 경제성장이 먼저인가, 혹은 다양한 나의 권리가 먼저인가의

가치관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세대 간 차이점이 현 정권에서 표면화된 것은 구시대적인 정책과 정부 영역의 확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에 의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수세력을 표방하는 정당과 행정부 주요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진보'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은 어떠한가요? 한국의 진보세력 혹은 진보정당이라 불리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과 같은 정당들과 각종 단체들은 진보이념 본연의 가치인 '국제주의'와 '인권'의 가치 실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반미여론은 특정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봉쇄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특히 경제, 정치, 안보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제1의 우방국가와의 관계 악화를 시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변국가와의 현안에 관련해서도 별다른 의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 가치실현이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 세계 최악 수준의 북한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감싸는 것은 올바른 자아 가치실현이 아닐 것입니다. 탈북자송환문제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명이 없다는 것 역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고 있는 행동입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분단'이라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성된 진보이념의 친북프레임은 진보세력의 확장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날에도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직접위협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안보'는 여전히 절대가치로서의 자리를 확고히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는 반공이념이 정략적으로 활용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보세력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북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여전히 국민들이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구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 구조 속에서는 전국 정당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지지층도 특정 계층에 국한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노동자가 밀집한 주요 공업지역의 지역구에서도 진보정당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현실화됐습니다.

이는 진보이념과 세력이 스스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친북좌파의 틀을 깨지 못한 것 역시 스스로 성찰이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총선 이후 붉어진 통합진보당의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스스로 세력을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 진보추구 세력이 후퇴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단동원 선거를 비난하며 시작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실험들이 대부분 무의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에 재등장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이나 '당권파'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은 그것들의 진위여부를 떠나 친북좌파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진보세력의 후퇴는 그 동안 지속되며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던 야권연대의 대선에 대비한 재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국 불가피하게 형성된 양당간의 대결구도는 다시 한번 정치에 대한 양비론이 작용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보세력의 위기는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며 통합과 연대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고 당내 장악력을 높이려는 권력투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명지대 강규형 교수는 오늘날의 자칭 보수세력을 '생각 없는 얌체'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보당의 상황을 보면 누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세력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한국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도 이념대립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가치관의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은 자연스러운 민주주의국가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모순적일 수는 있지만 스스로의 체제를 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찾기 어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이념적 가치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 발현하여 주어진 이념들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입맛대로 변형되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적 특수성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념적 가치를 논하고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날까지 형성된 한국형 이념들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4월 29일은 윤봉길의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제에 항거해 의거를 일으킨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올해는 그 의거의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는 거사 직전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하였습니다. 백 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들 계십시오'라는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유서 속에서 그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조국과 동포는 어떤 곳이며 누구의 나라였을까요? 보수의 나라? 혹은 진보의 나라? 오늘날 이념 논쟁 속에서 퇴보하고 있는 한국과 국민들은 윤봉길 의사가 말하고 있는 조국이 아니고 동포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체제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과정 속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념 간 갈등으로 인해 한국 선진화와 국익추구를 저해하거나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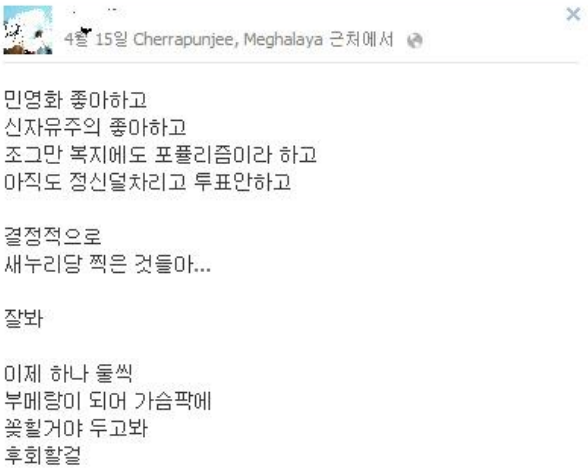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윤봉길 의사가 하루라도 살아가고자 했던 해방 조국의 하루이며 과도한 이념논쟁으로 얼룩지기엔 너무 소중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③ 박민진(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지난달 11 일에 19 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열렸습니다. 총선 결과가 나오기 직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진보 정당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실제 결과는 새누리당이 전체 300 석 중 152 석, 자유선진당이 5 석을 차지하면서, 보수세력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당선자들의 논문 표절 의혹이나 성범죄 혐의 등은 보수의 승리가 진정한 의미의 승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큰 행사가 있었던 만큼, 63 차 월례토론회에 이어 지난 4 월에 열린 64 차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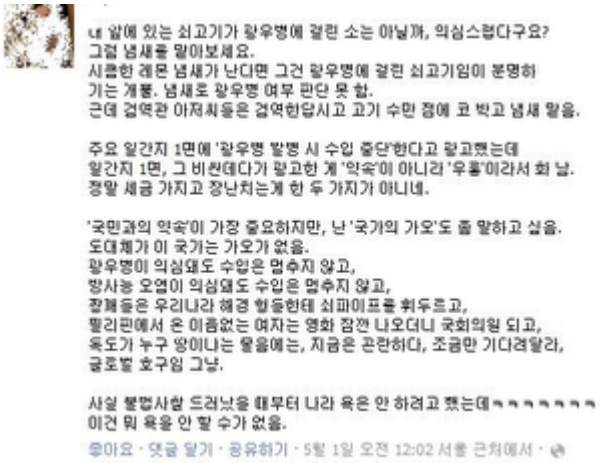
월례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기존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진보세력과 비교하면서 '지금의 진보세력이 진짜가 아니듯이 보수세력 또한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라며 자성을 요구했는데요. 그렇다면 토론자들이 제시한 진정한 보수세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보수세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보수세력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방향에는 무엇보다 보수세력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토론회에선 요즘 젊은이들이 진보세력 쪽에 더 많은 공감을 가지는 이유를 기존의 보수세력이 현실에 안주해서 고인 물이 됐기 때문이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보수세력이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뜻하며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의 목적을 외면하고 인기에 영합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를 망각하는 정치 행태"라고 정의됩니다.

보수세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심각해진 사회 양극화 현상 속에 진보세력이나 정부가 선심성 공약을 하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보수세력이 복지정책의 이모저모를 잘 감시해서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복지 혜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지원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설득시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바꿔볼게요. 20 대 대표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고함(http://goham20.com/1737)은 지난 3 월 30 일부터 4 월 2 일까지 서울, 대구, 부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 세 이상 대학생 1073 명 (서울: 614 명, 부산: 236 명, 대구: 223 명) 을 대상으로 정치성향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46.77%가 '중도' 24.29%가 '진보', 13.95%가 '보수, '14.99%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학생 친구들 사이에선 보수세력을 지지하거나 스스로 '보수'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은 진보성향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에 비해 그 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보수세력이 향후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는 20 대 계층과의 소통 및 교류가 적었다는 결과로도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 친구들에게 새누리당이나 보수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실망했던 경험이 한 몫을 차지하는데요.

취임 초부터 논란이 되었던 도덕성 논란, 예를 들면 BBK 의혹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대통령 직무를 수행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의 파이시티를 둘러싼 측근비리까지 밝혀진 사실에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하거나 분노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8 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 당시 불안을 느낀 국민이 소통을 강하게 요구해도 세종로에 거대한 컨테이너 벽을 쌓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국민의 걱정이 무엇인지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일방소통'의 강요로 20 대 대학생들의 보수세력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악화됐습니다.

실제로 몇몇 친구들의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기존 보수세력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글을 많이 올려 놓고 있는데요. 더 이상 보수세력은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는 친구도 적지 않습니다.

광우병 발병 전력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치에 불안을 느끼며 2008 년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가 물대포를 맞아본 친구들은 이러한 현실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 시위의 현장에서 기존의 보수세력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트위터 영향력 순위 1월 31일 현재, 51~100위는 동아닷컴(www.donga.com) 자료: 미디어, 유저스토리랩

순위	이름	직함	팔로어 수	팔로잉 수	트윗 수	클라우트 지수
1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19만9893	1만5136	8807	74.40
2	박원순	서울시장	37만3317	3만3535	1만275	74.24
3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14만1387	2만3410	139	74.02
4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7만7396	1만4790	7736	72.57
5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16만8280	8600	459	71.45
6	정동영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9만1318	9만916	1만4068	69.89
7	강용석	무소속 국회의원	1만9665	299	777	69.07
8	김문수	경기도지사	4만9107	4만4204	5956	68.56
9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38만7734	2만7705	754	68.54
10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16만5545	4656	148	68.44
11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6만8968	5만4384	1017	67.44
12	홍정욱	한나라당 국회의원	5만2711	5136	449	66.21
13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16만198	8만3175	3622	64.74
14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5만4568	2만9609	3677	64.65
15	최문순	강원도지사	9만2463	8만6472	1122	62.24
16	김진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4만475	3만2137	1만2387	61.72
17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	3만33	3954	373	61.14
18	전현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3만2612	3만4341	1만1359	60.42
19	전여옥	한나라당 국회의원	1만4871	1만4838	4409	60.41
20	이석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만9871	1만9326	1328	60.35
21	안희정	충남도지사	8만9243	5만9395	5350	59.92
22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3만5259	3만9326	4740	59.85
23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1만3587	1만1229	8590	59.84
24	강기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6만5876	6895	4004	59.47
25	천정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7만1044	5만9419	6567	59.19
26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3만1175	2만3177	2002	58.78
27	이종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3만128	3만312	1365	57.22
28	정몽준	한나라당 국회의원	4만4595	3만8302	697	56.62
29	손학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5만907	2만2619	205	55.77
30	송영길	인천시장	8만8531	1만4878	1598	55.64
31	권영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3만8749	5680	3418	55.34
32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1만9072	1만2332	960	55.12
33	김관진	국방부 장관	9420	8613	71	55.05
34	김두관	경남도지사	5만2052	5만712	167	55.02
35	이인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4948	5438	466	54.64
36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만1311	8974	471	53.63
37	남경필	한나라당 국회의원	1만4895	1만2349	1019	53.34
38	김선동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1만6320	4732	797	52.94
39	김유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만5177	1만259	5554	52.86
40	우제창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9849	9311	364	51.96
41	원혜영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만9140	1만9462	2629	51.96
42	안민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7612	2801	445	51.62
43	박주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만7042	1만8722	859	51.41
44	전병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3만8423	3만8877	5627	51.19
45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7822	7515	3841	51.17
46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8898	5565	2191	50.57
47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2798	1495	837	50.37
48	추미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2만9664	8854	599	50.19
49	김성식	무소속 국회의원	5717	6214	1346	49.51
50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	1만8072	1만9837	635	4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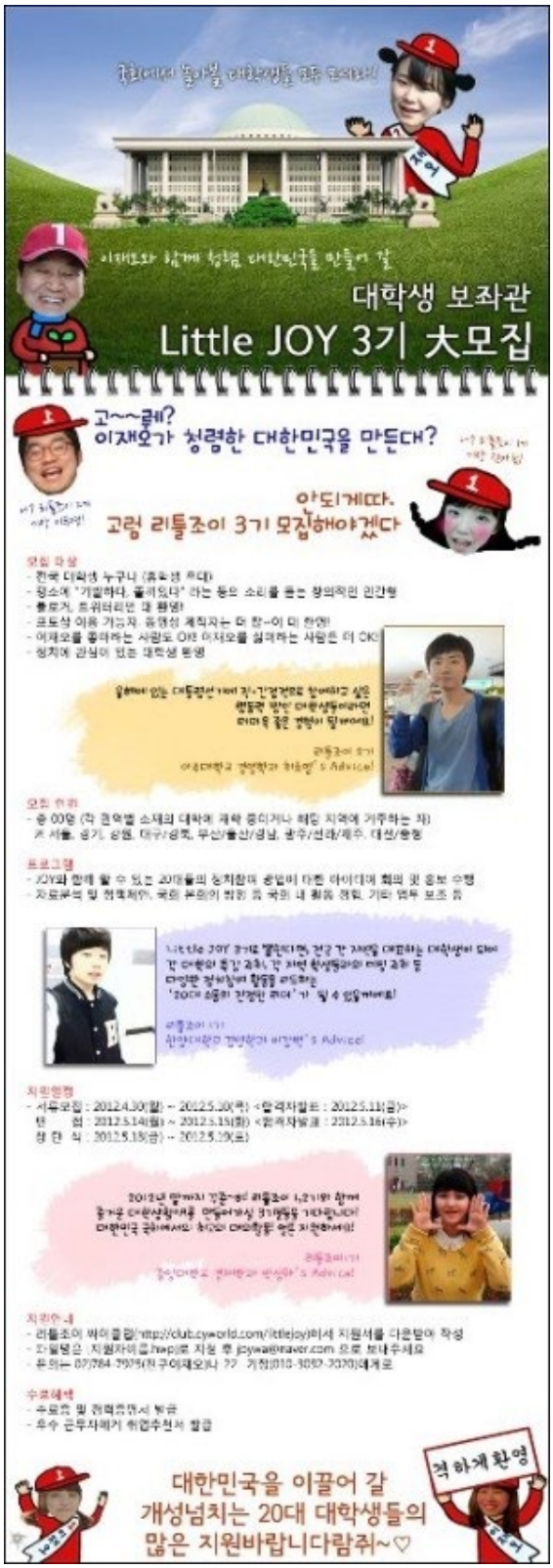
물론 인터넷에 유포되는 이런저런 얘기 중에는 오해나 왜곡된 것도 많긴 합니다.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트위터 괴담이나 근거 없는 비방 등으로 몇몇 후보가 피해 당한 사례를 보면서 젊은 유권자의 표를 잃어버린 보수세력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바로 '소통'입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야당의 박원순 후보와 여당의 나경원 후보 간 SNS 차이는 바로 '소통의 SNS 인가', 아니면 '홍보의 SNS 인가'라는 부분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당인 나경원 후보의 트위터에는 나경원 후보의 공약 관련 내용이 대부분인 반면, 박원순 후보의 트위터에는 사람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한 것 등 소통하는 시장후보로서의 이미지가 돋보였습니다.

보수세력이 더 이상 젊은 층에게 신뢰를 얻지 못 한다며 소통하지 않고 자신만의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젊은 세대에게 욕만 잔뜩 먹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보수세력 중에서도 젊은 층과의 소통을 통해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씨와 총선에서 맞붙었던 손수조 후보는 여당에선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아이콘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16 일 저녁 한국대학생 포럼에서 손수조 후보는 150 여 명의 대학생들과 연애경험 등 소탈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의 이재오 후보는 대학생 보좌관을 모집하여 청년들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세력에 비하면 보수세력의 소통에 대한 노력은 아직도 한참 부족합니다. 정치인 파워 트위터리안 대부분을 진보세력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많은 젊은 층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자신이 뜻하는 바를 알릴 수 있는 보수가 아닐까요? 제한된 연령층만 대표하며 향후 대한민국의 주축이 될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기존 보수세력은 진보와의 대결에서 갈수록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20 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집니다. 정치는 올해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세력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 위해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④ 박정욱(세종대학교 교육학과)

지난 4 월 한국선진화포럼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총선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이 여당의 자리를 유지하였지만 이를 두고 진정한 승리라고 보는 사람을 드문데요. 오히려 야당에서 여러 사건들에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여서 나온 결과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새누리당은 기존의 '부자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오랫동안 사용하였던 당명과 로고를 바꾸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권대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과거와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통합민주당의 패배를 두고 진보의 퇴보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누리당을 보수로 생각하고, 통합민주당은 진보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을 보수당과 진보당이라 분류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 정치사상은 우리 정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보수라는 것은 찬란하고 유서 깊고 고귀한 역사적 토양 위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제대로 된 보수주의 정치사상이 뿌리박은 나라는 미국과 영국, 두 나라 밖에 없다는 점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조가 이어져 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과거 정권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진보는 빨갱이, 보수는 좋은 것이라고 못 박고 거기에 맞춰서 많은 일들을 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일부 보수층에선 진보는 빨갱이, 보수는 좋은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원래 진보는 사회적 연대, 평등, 분배, 민주성을 강조하며 보수는 자기책임, 자유 성장,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구분하는 편이 맞습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는 대립하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는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둘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느 하나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불행뿐만 아니라 국가의 불행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⑤ 여정민(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오늘은 우리나라의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해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항상 있어 왔지만 요즘처럼 보수의 입지와 노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수가 지향하는 이념이 변화하는 세계 각국의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일까요?

저는 우리가 탓해야 할 것이 안일했던 현 보수 정권과 지배층이지 보수의 이념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어요. 지난달 월례토론회 칼럼 주제로 보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적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수의 이념이 정치,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21 세기 세상에서 어떻게 발을 맞춰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업그레이드와 적응은 필요해도 보수이념의 본질은 여전히 현실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랍니다. 이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쉽고 재미있게 생각해봐요!

일단,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의 압축적 고도성장에는 보수의 경제제일주의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민주주의나 인권 등과 같은 가치와의 근본적 충돌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은 개발도상국의 전형적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과를 이룬 후 성장제일주의에 대한 많은 회의와 각성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장만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폐해는 2008 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복지논쟁이 여전히 시끄러운 것을 보면 또 다시 성장과 분배의 사이에서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듯합니다.

'월가 점령 시위'를 보면서 "아, 이제 자유주의의 시대는 갔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장동력을 무시한 채 복지 포퓰리즘으로 연명하던 유럽경제들이 쓰러져가고 있는 모습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부자용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독일의 경제가 주변 유로존 국가들과 뚜렷하게 대조되는 점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incentive 와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지나친 복지의 늪'에 빠져갈 때 독일은 더욱 적극적으로 바깥 시장을 공략하며 성장동력을 가동시켜 높은 경제성장률, GDP 의 1%도 안 되는 재정건전성, 수출흑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악화되는 재정건전성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사회불안이 번지는 등 사회문제를 겪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새라'라는 이름의 독일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새라는 독일 경제가 수출 경쟁력을 갖춰 성장이라는 가치를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처럼 빈익빈-부익부를 고착화시키는 구조는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독일의 복지 시스템도 개개인의 업무성과 차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잘 짜여 있으며 파이가 커질수록 나눠야 한다는 사회인식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독일은 성장과 분배의 이상적인 접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2 월에 이 친구를 보러 독일에 2 주 동안 여행을 갔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독일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문화와 사회인식 등에서 새라가 말했던 그 접점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확 와 닿았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의 이념을 규명해보고 현 국제정세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국가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봅시다! 인터넷에선 Hubs and spokes 로 상징되는 미국 중심의 security 동맹이 필요하냐, 오히려 통일을 저해한다. 더 이상 반공이념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은 매도하는 것이란 말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이 다자주의의 질서로 재편해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반공이나 자유주의 수호, 국가보안이라는 구호들은 종래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시아는 냉전시대의 전체적 framework 가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질서가 유지되어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북한이 여전히 '서울 불바다'를 외치면서 위협하고 북한 주민을 핍박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중국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냉전시대와 다를 바 없다 했죠? 여전히 중국, 북한, 러시아의 authoritarian 블록과 자유주의 블록, 즉, 남한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이루는 대립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실체적인 것입니다. 중국이 민주주의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 한-중-일 3 국의 경제통합이 UN 과 같은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3 국의 관계를 이루는 상부구조를 떠받쳐줄 하부구조, 즉 민주주의, 평화, 번영의 가치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21 세기에도 보수의 가치와 이념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⑥ 이세학(한남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한국 진보는 경제적 자유 확대를 반대하면서 미래보다는 과거를 주된 전쟁터로 삼고 있으며, 보수는 안보와 경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노동 3 권이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이 말은 한국 현대정치사론이라는 책에서 저자 김일영 교수가 쓴 말입니다. 제가 한국 이데올로기 세력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보수와 진보세력이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는데요.

저뿐 아니라 이번 한남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 참여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특히 최근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더욱 더 팽팽해지고 있는데요.



연구모임 참여자들은 한국 정계에서 보수세력을 주로 연세가 드신 정치인들이라고, 또 진보세력은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번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정치권 뉴스는 항상 양 측이 서로를 비방하는 뉴스뿐이라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이처럼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은 과거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야기시켰던 당파싸움과 6.25 전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대립을 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각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좋은 예가 현재 한국 지배구조의 삼권분립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턴가 우리나라의 정치는 서로 헐뜯기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잘한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거나 배우기보다 진보세력은 과거 보수세력이 했던 일에 대한 비판을, 보수세력은 진보세력이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만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국내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모임 참가자들도 높은 등록금, 낮은 취업률을 체감하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정치권을 보면서 점점 무기력해 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치와 관련해 항상 쉽게 듣는 뉴스 중 하나가 '국회 본회의 무산', '민생법안 뒷전'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도대체 그렇게까지 과거에 집착하면서 득이 없는 말싸움으로 인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피해를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이 이제 선진국의 문턱까지 다가왔다, 아니 이미 도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치 부문에서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정치문화를 위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합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집안은 국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국회에서 항상 서로 치고 받고 싸우기만 한다면, 열심히 달리고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 선진국들에게 추월을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국회 폭력예방법 처리가 우리 정치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타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출발점은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우선시돼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상관 없이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하나 둘씩 보입니다. 지난해 7 월 27 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통합의 행사가 그 중 하나인데요. 중앙일보사가 주최한 이 행사엔 사회통합위원회에 소속된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교수들이 참석해 많은 합의점들을 냈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선 보수이든 진보이든 누구나 다 인정해야 할 부분을 5 가지 정도로 요약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우리 헌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는 각각 성과를 갖는다”입니다.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시절, 독재로 인한 중앙권력형 정부가 생기게 되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 의지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선진화 연구 모임원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는데요. “민주주의가 무시된 경제발전으로 인해 현재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대외경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라는 의견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꿈을 꿀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가치에 대해선 서로의 의견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통해 경제개발 후의 우리나라 사회제도가 좀 더 민주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발언권도 강력해지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21 세기에도 대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중심원리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국회가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입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의 한국 정치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다”라는 합의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현직 정치인들에 의해서 도출된 합의점은 아니지만 보수, 진보 진영에서 이러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정치인들도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아픈 과거가 있지만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민족으로서 단합이 잘된 나라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1988 년 서울 올림픽, IMF 시절의 금 모으기 운동, 2002 년 월드컵 시민광장에서의 길거리 응원 등을 통해 보여준 한국인의 단합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민이 단합해서 여러 국가 행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됐으며 지금도 해외에선 한국의 단합력에 놀라곤 합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불과 50 여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이 작은 나라가 OECD 에 가입하고 무역 1 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원조수혜국에서 원조지원국으로 바뀌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은 그러한 점에서 감동과 기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보수, 진보가 비효율적인 대립을 이어가기보다는 모두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품고 나라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인 장치로는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개인의 의식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지역구 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소 추상적인 해결책밖에 없다는 것이 저도 아쉬울 따름이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의식개선과 양보, 타협, 그리고 위에서 나왔던 5 가지의 합의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⑦ 이윤하(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지난 4 월 한국선진화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제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요. 그래도 ‘보수와 진보’는 언제나 핫(hot)한 사회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에 대해서, 그리고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보수란 무엇일까요? 우선 사전을 찾아보면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상’을 보수주의, ‘기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사상’을 급진주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하여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사상’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흔히 급진주의와 개혁주의를 묶어 진보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을 보수,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변혁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세력을 진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대립하고 그 대립을 통해 서로 발전해 나갑니다. 흔히 보수는 사회지배층의 입장을, 진보는 피지배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계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100 여 년을 훌쩍 넘기는 서구 선진국들의 민주주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절충해왔고 그만큼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 산업화를 이룩하고 군부독재시대에 저항하여 민주화를 이룩해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100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기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표현에 따르자면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달려와 위로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라는 말로 축약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가로 체제가 확연히 다른 북한이라는 존재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보수와 진보는 존재하는 걸까요? 제가 살고 있는 대구는 보수 정치성향을 지닌 대표적 도시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을 지녔고, 가끔은 '수구꼴통'이라는 욕도 먹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대구는 언제부터 보수적이었을까요?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대구의 보수주의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대구 시내를 둘러보면 2.28 공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한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공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채보상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도 대구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혜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구에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구의 보수적 정치성향은 박정희 정부 시대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에서 시작됐고 그 특혜를 누렸던, 그 향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970 년대 경제개발을 위해 재벌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이 대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인 점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이 누릴 수 있었던 특혜는 많았습니다. 서울과 영남권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통된 점, 울산이나 구미 등 영남권으로 공업단지가 들어선 점도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정재계의 요직을 영남권 인사들이 독점했던 점도 대구의 보수적 정치성향을 만드는데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사람들에게 보수와 진보는 철학적, 신념적인 사회 이데올로기적 개념이기보다는 자신에게 어떤 형태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대한민국에는 명확하게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업인들은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고 싶고, 노동자들은 노동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고 싶고, 학생들은 비용이 덜 들지만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기득권이란 말로 표현하죠.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도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득권을 악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본이 노동보다 유리한 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독과점이나 불필요한 요소의 과대 생산 등의 시장실패를 비롯한 내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득권, 자본을 가진 기존의 보수세력들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가진 자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작습니다.

기득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지식이 필요한,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탐욕적인 방향이 아닌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주체 세력입니다. 따라서 대학생 스스로가 보수와 진보에 대해 나름의 해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소통 없는 대립에 아귀다툼만 일삼는다면 더 나은 미래는 한낮 달콤한 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대학생들이 조금 더 역사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복잡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정치 역시 국가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중대사인 만큼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지식 습득과 이해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둘째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는 불통의 문제를 끊어 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고 그 정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주장만 관철시키려 한다면 우리가 부정하려는 현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나눠서 싸우기보다 서로 공존하고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가 보장된 선진사회를 이룩해야 합니다. 조금 더 발전된 보수와 진보를 꿈꾸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⑧ 이정하(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난달 4.11 총선에서 행해진 공약 중 가장 HOT 한 것은 무상복지에 관한 각 당의 입장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당이 여당과의 견해차이를 위한 공약으로 규명되던 것이 국민의 정권비판과 맞물리면서 여당이 위기를 느끼자 여당 역시 재빨리 무상복지를 큰 타이틀로 4.11 공약에 내걸었는데요.

물론 각 당마다 적용범위와 지원방안 등 세부적인 정책 면에서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무상복지라는 큰 틀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것은 같습니다. 여당이 초기 무상복지를 향해 포퓰리즘적이라며 강한 비난을 하다가 정책을 바꾼 것은 자리다툼에서 우위를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일 것입니다.

더욱이 여론의 반응이 초기와 달리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큰 작용을 하였을 것입니다. 정치에서의 이런 일은 다반사이므로 그러려니 하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정치권의 자리다툼으로 내세운 공약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사회의 무상복지정책의 실현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찬성론자들에 대한 두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첫째, 무상복지의 재정적 지원은 누구한테 얻을 것인가? 둘째, 무상복지의 롤모델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첫째 물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무상복지의 재정적 지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통한 재정적 확보이고 또 하나는 재산세, 소득세를 통해 부자세를 거두는 것입니다.

전자를 기준으로 무상복지의 전면비용을 충당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2 배 이상의 세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3 월에 중앙선관위와 한국정당학회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복지 확대를 위해 지금보다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생각이 있느냐?' 질문에서 응답자의 41.5%가 '더 내기 어렵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응답자 12.4%가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들 중 42.5%가 '세금은 더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이기적인 설문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무상복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주된 방안은 재산세와 소득세를 통한 부자세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이를 복지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인데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끼칠 악은 전혀 없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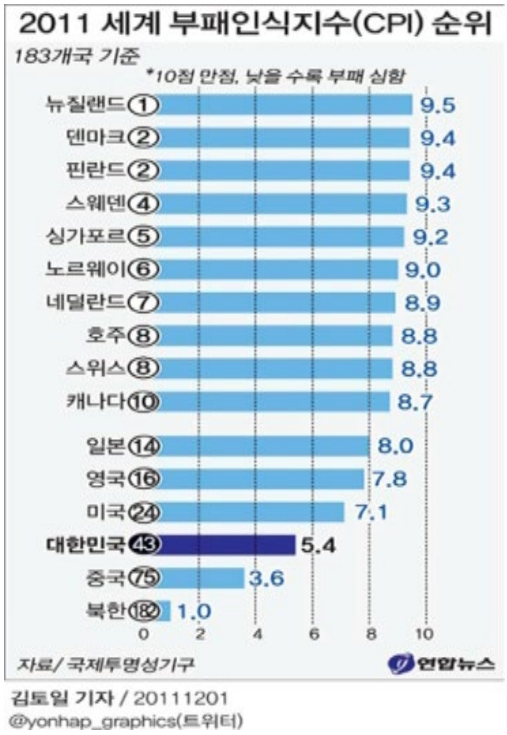
저는 이것이 실현화된다면 훗날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에게 걷히는 세금이 다른 계층 국민을 위해 사용이 된다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어 재원부담자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재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데 이들의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면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사업과 투자 의욕을 꺾으며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복지국가의 롤모델로 누구를 선정해야 하는가 입니다. 복지가 잘되어있는 나라들은 주로 유럽에 있죠. 그 중에서도 남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3 국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중 우리와 사회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국가를 선정하여 복지의 길을 닦는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적을 것입니다. 최근 남유럽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북유럽의 3 국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안정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남유럽의 3 국과 북유럽 3 국의 상황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그것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국가의 방만한 경영과 국민의식의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은 2011 년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스페인만이 50 위권인 31 위에 들었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지하경제의 규모와 탈세수준 그리고 뇌물 등 부정적 행위가 서유럽의 1, 2 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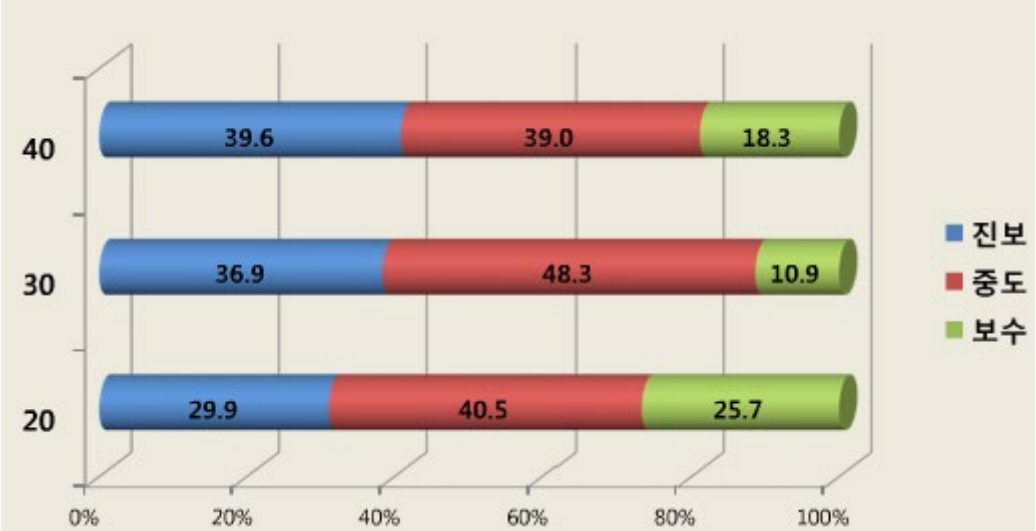
반면, 북유럽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의식이 발달하여 국가 청렴도에서 세 국가 모두 다 상위권(덴마크 2 위, 스웨덴 4 위, 노르웨이 6 위)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43 위로 낮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과 사회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복지가 실현된다면 그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두 가지의 물음에 나온 답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아직 우리나라에 무상복지를 추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재정충당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설령 재정을 충당시킨다 해도 앞서 나온 두 가지 방안은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롤모델의 부재입니다. 국가청렴도가 하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성공한 무상복지국가를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상복지를 실현한 날이 온다면 그 시점은 국민의식수준의 향상과 경제구조가 다양하게 개편된 시기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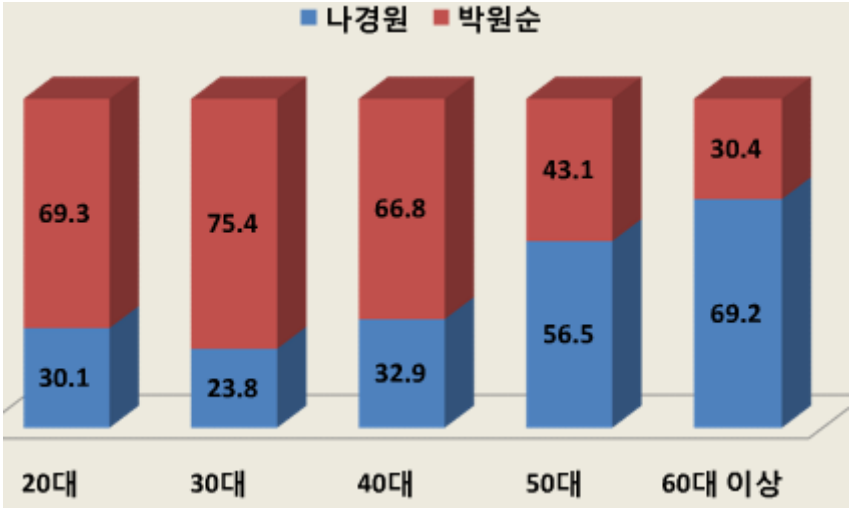
⑨ 이태용(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세대 별로 정치적 성향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젊은이에 해당하는 세대인 20 대나 30 대 또는 넓게는 40 대까지 오늘날 '진보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반면, '보수'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50 대 이상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다.



이처럼 2040 문제라고 하며, 세대적 간극이 사회적으로 주목될 정도로 소위 사회에서 젊은이로서의 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에 치우쳐져 있으며, 또한 반대로 '보수'라는 가치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선, 20,30,40 대의 젊은이들은 모두 무언가로 인해 불안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세대이다. 20 대는 실업과 높은 대학 등록금 등으로, 30 대는 생활의 빠듯함으로, 40 대는 교육비와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으로 쫓기듯 살아간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힘든 삶 속에서 기득권 층에 대한 분노를 내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들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그들의 힘을 합쳐서 그들이 원하는 가치 즉 진보라는 큰 가치의 틀에 포함되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대한 연장선에서 실천으로 옮겨져, 작년 10.26 서울 시장 재보선 때 보수의 진영의 처참한 실패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젊은 이들이 '보수'라는 가치에 공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소통의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소통이다. 아직까지 보수 진영이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이 부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권의주의적, 엘리트적 특성으로 인하여 소통이 단절되어 있기도 하였다. 또한 젊은 세대와 보수 진영이 사용하는 매체의 상이함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SNS 또는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한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주로 아날로그 매체를 통해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하고자 해서 이것이 용이하게 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보수 단체는 추구하는 가치들을 경직적으로 추구하며, 젊은이들의 웃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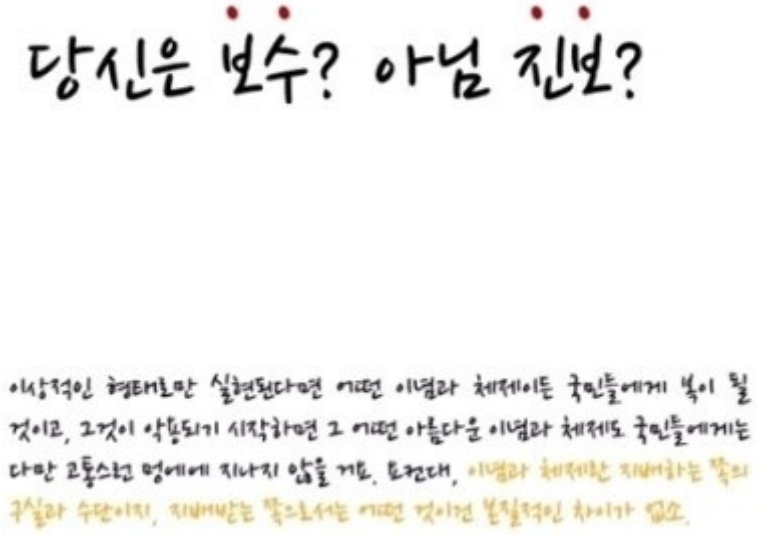
결국,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는 수의 세대가 진보 진영에 기울이는 성향을 보이게 되면서, 보수 진영 또한 탈바꿈을 위해서 여러 방면의 노력들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 이는 전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탈바꿈하고 당의 체제의 혁신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부터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가치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균형잡힌 시각을 위해서는 진보 측에 기울어진 양상은 그리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보수 진영은 새로운 탈바꿈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⑩ 정다래(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4 월 월례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이 경제 분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도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정치 얘기를 할 때면 우선 정치성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에 관해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보-보수 프레임에 갇혀 개인의 사상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례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았던 박성현 정치평론가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뿌리 박은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며 잘못 해석돼 쓰인다고 합니다. 진보는 정통 좌파 전체주의자들의 '역사 진보'에서 나온 개념이며 그들은 '진보-보수'가 아닌 '진보-반동' 프레임을 썼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에게 진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역사 진보'에 대한 이념과 신념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통 좌파 전체주의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박 평론가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에서만 정치적 보수주의가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된 제도와 가치가 현실적 의미(relevance)를 가진 토양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보수를 우파라 부르는 것은 좌파가 선명하고 맹렬할 때 등장하는 구원투수 역할일 때만 가능하다는데요. 지금은 진보가 진정한 좌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수 역시 우파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어 박 평론가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는 개혁 리버럴 리더십에 해당하며 보수와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좌-우가 선명하지 않으며 진보와 보수라는 의미자체가 변질되어 자리잡았기에 진보-보수 프레임에 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에 대한 지금의 프레임을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토론회에서 박 평론가는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좌파의 이름은 종북, 친북, 떼-촛불의 복합체로 '종친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화 헤게모니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SNS 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사회에 관한 반발심을 바탕으로 대중을 선동하며 남한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 대한민국 사회통합을 저해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추종은 객관적 판단과 현실성이 결여되고 현재 남한 사회가 추구하는 정신과 대립하면서 혼돈을 일으키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2008 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촛불시위는 전 국민적 활동으로 번지면서 정부와 국민의 불신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에 대한 반발심과 의견을 표출하는데 집단 촛불시위가 종종 등장하게 되었고 정치, 사회적으로 의견을 분리시키며 사회통합을 저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의지와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며 거리 시위를 통해 국민과 정부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데 도움을 준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평론가는 오늘날의 한국 보수가 미덕 결핍으로 개인의 실존과 자유에 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았는데요. 정치에 대한 분석도 도덕적 철학에 근거하며 자아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상태에서 미덕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에 관한 대중소통이 부족하고 직업윤리의 도덕적 해이는 진정한 보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평론가는 앞으로 보수는 '자유+생명+지킴이-촛불'로 자생초 정신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개인 실존의 '나다움', 진실에 대한 존중, 이를 통한 자아의 고민과 완성이 보수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봅니다.

토론회를 보면서 보수의 한계점 극복에 도덕적 성찰과 자아발견이 중요한 의미로 자리잡는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정치는 사회문제이며 자아가 분리된 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와 도덕의 철학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석이 돋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며 분리하여 생각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은 다를 수 있지만 이는 서로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진보와 보수의 정확한 프레임 구축에 대한 논의를 들으며 서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지향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 구축과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대한민국 사회가 대립,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진보 세력은 문화 헤게모니를 통해 사회의 힘을 키우고 있으며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사회에 여러 의견이 충돌되면서 갈등을 만든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수 세력은 겸허한 의견 존중과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하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야 합니다. 진보가 있기에 보수가 존재하고 보수가 있기에 진보가 존재하는 상호 대립 개념은 공존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잘못 자리잡은 부분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개념을 다시 돌아보며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를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가지 틀로 나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이 대다수이며 여론 몰이에 이끌려 무조건적인 비판과 체제 부정을 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우들이 '진정한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김은정(경영 2): 동영상을 보면서 보수의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라 함은 보통 현 정부를 이끄는 세력이고 그 외의 정당이 진보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백승원(경제 2): 그 말에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진보와 보수의 대립의 형태로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몰랐는데 이번 월례토론회 동영상을 보고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지현(경영정보 2): 보수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앞으로 저희 20, 30 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며 대중에게 다가오려 하고 있지만 그 공약보다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더욱 심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SNS 나 인터넷 뉴스 등의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했기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나은(경영정보 2):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약과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우리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데 그러한 점을 저희 대중에게 어필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에 더욱 치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예준(경제 2): 가끔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정치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곤 하는데 '이래서 보수는 안 된다', 또는 '이래서 진보는 안 된다' 와 같은 댓글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 중에 특정 정당에 대한 불만을 내세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여론몰이에 쉽게 이끌리는 젊은이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은정(경영 2): 그렇다면 정치권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또한 일반 대중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해보았으면 합니다.

도나은(경영정보 2): 저는 우선 선거철 반짝하는 정치인들의 선거 쇼(show)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일부 이를 이용하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정말 자신의 신념과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선거 홍보 기간에 매체에 등장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치중하기보다 당선 후에 공약을 지켰고 또한 다른 긍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그들이 매체에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백승원(경제 2): 맞는 말입니다. 정당들 역시 서로를 보수, 진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의 근거를 토대로 그들의 주장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어도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예준(경제 2) : 정치권 말고 일반 대중들 역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60 대의 기성세대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정치를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2,30 대의 청년층 역시 그저 이끌리기보다는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나갈 기둥이라는 책임 하에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한 필요가 있습니다.

임지현(경영정보 2) :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이제서야 지식인이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② 한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세학(멀티 3): 동영상을 보고 난 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형태로 전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은 만큼 수정해야 할 오류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보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현학(광고홍보 3):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일단 국회의원으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선거풍토,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게 실망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임태준(광고홍보 3): 그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비록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야당의 힘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가장 큰 요인이 기존 보수 세력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 비대위를 구성하며 이미지 쇄신에 노력했지만 기성 정치인들을 끌어안으면서는 절대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 눈에 비치는 보수 세력의 이미지는 탐욕스러운 집단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듯 합니다.

이세학(멀티 3):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도 토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윤호(경제 3): 우선 마음가짐부터 다르게 가져야 합니다. 자신들이 무조건 집권층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국민들은 예전에 비해 똑똑해졌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치로는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가 절대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지혜(멀티 4):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방식에 불만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국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강행처리 하는 것은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이유나(멀티 4):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보 진영에도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사건도 그렇고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표퓰리즘' 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아직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FTA 국회 비준동의안이 강행적으로 처리됐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두고 자신들이 집권여당이 될 경우 무효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위험한 발상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학(멀티 4): 제가 생각하기에 결국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소속 정당이 집권 여당이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보수란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보수의 모습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변진영(멀티 4): 가장 큰 바람은 우선 소통입니다. 과반이 넘어가면 한꺼번에 국회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과반이 넘어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2012 년은 총선도 있었지만 대선도 있는 해 입니다. 국민들의 위에 있는 보수가 아닌 국민들을 섬기는 보수가 되길 바랍니다.



신현학(광고홍보 3): 2012 년 대선 역시 보수 진영의 대표와 진보 진영의 대표 간 싸움으로 예상됩니다. 보수, 진보를 나눠서 서로 당권 대립을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나(멀티 4): 민생법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고민에 신경 쓰는 것은 진보 쪽에서 더욱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진영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등록금, 취업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선진화 과제 12: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제 103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권순형(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어떻게 이룰까요?

한국경제는 저성장 속 분배의 양극화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이 5 월 26 일(목)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10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양병무 교수는 공유가치창출 정신을 기업 내부의 경영자와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외계층, 기업과 교육 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착한 선진화의 실천방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경영자는 선비정신으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 1 명 더 고용하기 운동'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노사정(勞使政)이 참여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철학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유가치창출 정신을 경제주체와 각 분야에 확산하여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상생, 공존, 공감의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착한 선진화를 구축하면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동시에 이룬 품격있는 나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생, 공존, 공감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토론자인 김성국 교수는 “실질노동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실질임금은 꾸준히 감소하고, 기술혁신이 진행될수록 중간층은 더욱 무너져 양극화가 심화되며, 현존하는 모든 직업 중 47%가 향후 20 년 이내에 소멸한다는 ‘노동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드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가 선진화를 위한 한국기업과 사회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을 통해 산업을 재편하고 고용시장과 노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4 차 산업혁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인 “이영옥 교수는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사회는 나눔의 정신이 연결망으로 체계화될 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운 사람들의 유족들을 지극히 보살피는 것이 다 함께 하는 선진화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착한’ 선진사회는 각 개인이 스스로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임무 및 의무에 충실할 때 이루어지며, 어느 여건 하에서도 잘 산다 혹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선진적 감각과 감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갖춘 사회 엘리트 교육과 상식을 갖춘 건전한 중산층 양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전용사와 악수 중인 꼬마 아이

선진사회일수록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운 사람들이 잘 대우받으며, 시민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미국 Washington DC 에 있는 Olympia Park 는 우리나라의 현충원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미국 국민들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악수를 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는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존경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미국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운 이들을 잘 대우하는 사회야말로 정의(正義)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이 있었기에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이 풍요롭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은 어떤 대접을 받나요? 상당수의 참전용사 어르신들은 폐지를 주워 끼니를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의 나라를 도와준 군인도 저렇게 대우를 받는데, 막상 자기 나라를 구한 군인들은 대접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극단적인 세력에 의해서 통일을 방해한 악마로 매도되고, 늙었으니 빨리 죽어야 한다고 소리도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회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그 누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겠습니까? 의(義)를 세운 이들을 잘 대우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유족들은 국가가 지극히 보살펴야 대한민국이 하나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6.25 참전용사 수당을 현실화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참전용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있는 것인데, 정작 이들은 빈곤하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참전용사는 약 15 만 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의지만 있다면 재정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85 세로, 10 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공헌을 제대로 존중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도심 곳곳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독립운동가, 참전용사 등 의(義)를 세운 분들을 기리는 공원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 Washington DC 내의 Olympia Park 는 백악관으로부터 10 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구경을 하러 온 많은 이들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도 견학을 합니다.

우리도 광화문 근처, 청계천 근처 등 가족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에 의(義)를 세운 분들을 기리는 공원을 만든다면, 많은 이들이 그곳을 둘러보면서 국가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김으로써 대한민국은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국가로, 건강한 젊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군복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행하는 의(義)롭고 신성한 의무이며, 따라서 마땅히 자랑스러워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마치면 국가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열악한 사병 대우와 군대 내의 부조리에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군복무 중에 평생 안고 갈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습니다. 작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청년 장병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던 일은 젊은이들에게 '역시 헬조선',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을 퍼뜨렸습니다.

최소한 교전 중 부상을 입거나 순국한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중요성에 걸맞은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 환경을 최신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수강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등 희생하는 2 년에 대해 최대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어야 국가를 믿고 우리 공동체를 믿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회갈등이 심해지면서 노사문제, 구조개혁 등 선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면, 양보와 협력을 통해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도 금방일 것입니다!

② 김주헌(영남대학교 국사학과)



한국경제는 저성장 속 분배의 양극화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포용적 자본주의와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공동체 의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가 공유가치의 창출을 통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선진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제 10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양병무 교수는 공유가치창출 정신을 기업 내부의 경영자와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외계층, 기업과 교육 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착한 선진화의 실천방안이라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업의 경영자는 선비정신으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청년 1 명 더 고용하기 운동'에 참여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유가치창출 정신은 경제주체와 각 분야에 확산되어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과 공감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극화의 심화는 착한 선진화를 실현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토론자인 김성국 교수는 "실질노동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실질임금은 꾸준히 감소하는 문제, 기술혁신이 진행될수록 중간층은 더욱 무너져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 현존하는 모든 직업 중 47%가 향후 20 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7 세 아이들 65%는 미래에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노동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드는 파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가선진화를 위한 한국기업과 사회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을 통해 산업을 재편하고 고용시장과 노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4 차 산업혁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착한 선진화의 시작이다!

또한 토론자인 이영옥 교수는,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사회는 나눔의 정신이 연결망으로 체계화될 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운 사람들의 유족들을 지극히 보살피는 것이 다 함께 하는 선진화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착한 선진사회는 각 개인이 스스로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임무 및 의무에 충실할 때 이루어지며, 어느 여건 하에서도 잘 산다 혹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선진적 감각과 감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갖춘 사회 엘리트 교육과 상식을 갖춘 건전한 중산층 양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경주 최부자 가문'

우리의 역사 속에도 윤리경영이 존재했습니다. 경주 최부자 가문과 故 유일한 박사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주 최부자 가문입니다. 경주 최부자 가문은 400 년 동안 9 대 진사와 12 대 만석꾼을 배출한 명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100 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하라.', '찾아오는 손님을 후히 대접하라.' 등의 최부자 가문의 철학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과정에 있어 도덕성과 정당성을 갖추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습니다.



윤리경영의 대표적인 인물, 故 유일한 박사

두 번째, 유일한 박사의 사례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병든 민족을 구하기 위해 유한양행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윤리경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불법경영 및 탈세를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는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기업'으로서 정직한 기업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6 년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책임경영'의 첫걸음을 떼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소유했던 개인 소유의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과 기업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례를 들여다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비롯한 상생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윤의 극대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적정한 이윤을 지키며 신뢰를 얻었기에 큰 의미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시작으로 하여 우리사회가 착한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사진출처>
사진 2 : http://700km.tistory.com/164
사진 5: 연합인포맥스

③ 김한슬(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뉴노멀시대, '같이'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속 분배의 양극화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포용적 자본주의와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공동체 의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해보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제목 하에 10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성국 교원대 교수는 "실질노동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실질임금은 꾸준히 감소하는 문제, 기술혁신이 진행될수록 중간층은 더욱 무너져 분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 현존하는 모든 직업 중 47%가 향후 20 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 7 세 아이들 65%는 미래에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노동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드는 파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가선진화를 위한 한국기업과 사회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을 통해 산업을 재편하고 고용시장과 노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4 차 산업혁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사회는 나눔의 정신이 연결망으로 체계화될 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운 사람들의 유족들을 지극히 보살피는 것이 다 함께 하는 선진화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착한 선진화는 각 개인이 스스로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임무 및 의무에 충실할 때 이루어지며, 어느 여건 하에서도 잘 산다 혹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선진적 감각과 감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갖춘 사회 엘리트 교육과 상식을 갖춘 건전한 중산층 양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병무 인천재능대 교수는 공유가치창출 정신을 기업 내부의 경영자와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외계층, 기업과 교육 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착한 선진화의 실천방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업은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는 "기업의 경영자는 선비정신으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청년 1 명 더 고용하기 운동'에 참여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 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노사정이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철학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유가치창출 정신은 경제주체와 각 분야에 확산되어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과 공감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착한 선진화를 구축하면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를 동시에 이룩한 품격 있는 나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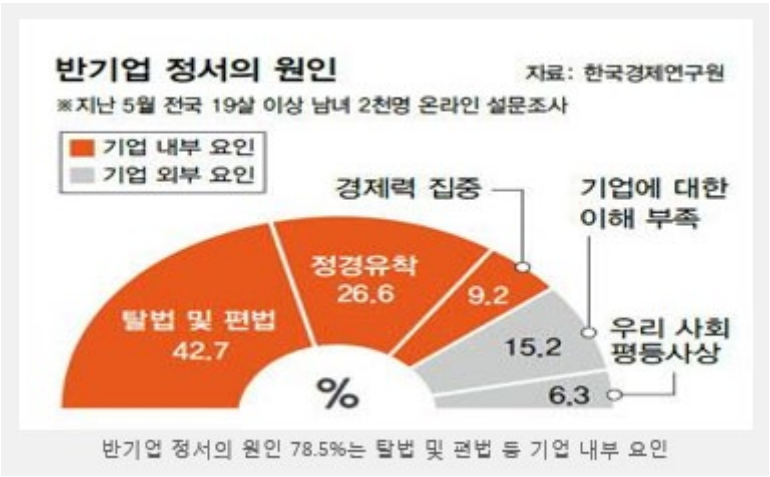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전국 20 세 이상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4 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가 10 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문별 점수를 보면 '국가경제기여'는 46 점, 생산성 향상은 60.4 점, 국제경쟁력은 70.7 점, 윤리경영실천은 21.9 점, 사회공헌활동은 39.7 점으로 윤리경영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이 다른 부문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도 윤리경영 미흡이 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회적 책임 소홀이 17.6%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 간 상생협력 부족(15.5%)과 고용창출 노력 부족(9.2%)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기업 정서의 원인 78.5%는 탈법 및 편법 등 기업 내부 요인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인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3 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반기업 정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기업과 기업인의 탈법과 편법(43%),

정경유착(27%), 경제력 집중(9%) 등 기업 내부 요인을 꼽은 답변이 79%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15%), 우리 사회의 평등사상(6%) 등 기업 외적 요인을 뽑은 답변은 21%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반기업 정서의 상당 부분이 기업의 횡령과 탈세 등 부정과 불법에 기인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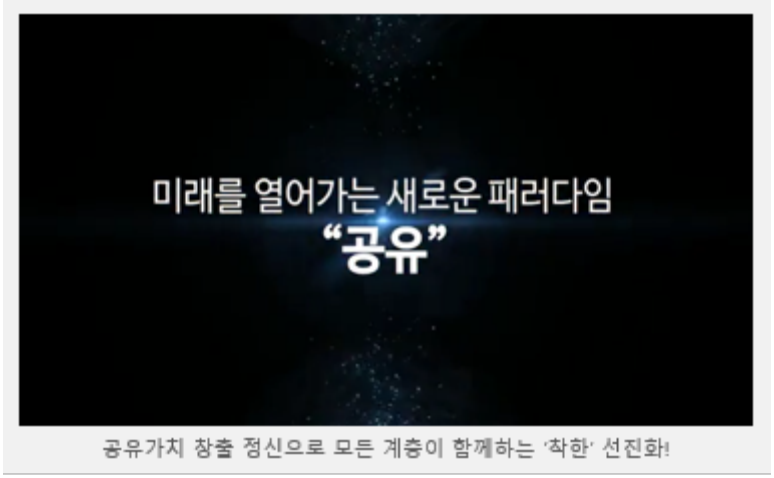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정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양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실제로 대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기업정서 확산은 일자리와 투자 저해 요인 2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성장과 분배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모든 계층이 다 함께 가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역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으면, 과도한 기업 규제가 불필요해질 것이며 기업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앞장설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윤리경영과, 공유가치창출(CSV)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윤리경영을 통해 탈법과 편법, 정경유착을 없애고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여, '기업에 반대하는 정서' 대신 '기업을 반기는 정서'가 우리사회에 확대되기를 바라봅니다.

2: econovill.com
4: blog.joins.com
5: biz.chosun.com
6: news.zum.com

④ 김효원(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한국 경제는 저성장 속 분배의 양극화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때이며 '착한'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발제자인 양병무 교수는 공유가치창출 정신을 기업 내부의 경영자와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외계층, 기업과 교육 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착한 선진화의 실천방안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자는 선비정신으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청년 1 명 더 고용하기 운동'에 참여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노사정(勞使政)이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철학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유가치창출 정신은 경제주체와 각 분야에 확산되어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과 공감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각 분야에서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착한 선진화를 구축하면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를 동시에 이룩한 품격 있는 나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눔의 정신으로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하자

토론자인 김성국 교수는 "실질노동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실질임금은 꾸준히 감소하는 문제, 기술혁신이 진행될수록 중간층은 더욱 무너져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 현존하는 모든 직업 중 47%가 향후 20 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7 세 아이들 65%는 미래에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노동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드는 파괴적 혁신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가선진화를 위한 한국기업과 사회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을 통해 산업을 재편하고 고용시장과 노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4 차 산업혁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인 이영옥 교수는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사회는 나눔의 정신이 연결망으로 체계화될 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운 사람들의 유족들을 지극히 보살피는 것이 다 함께 하는 선진화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착한' 선진사회는 각 개인이 스스로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임무 및 의무에 충실할 때 이루어지며, 어느 여건 하에서도 잘 산다 혹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선진적 감각과 감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갖춘 사회 엘리트 교육과 상식을 갖춘 건전한 중산층 양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감사히 여기며 나눔의 정신을 확산하자!

모든 계층이 함께 하는 '착한' 선진사회는 나눔의 정신이 연결망으로 체계화되고 각 개인이 스스로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눔의 실천을 기부처럼 물질적인 것으로만 여겼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눔이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남보다 더 가진 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며 각자가 가진 유무형의 자산입니다. 또한, 나눔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평등의식에 너무 집착하며 모두가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사는 사람을 보면 빈곤을 느끼고 불행해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회의 분위기는 점차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도 팍팍해지며 생기를 잃고 점차 회색빛 삶으로 변했습니다.



이웃과의 인사 나눔 실천으로 '착한'선진화 시작하자 !

이제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기 바쁩니다. 예전에는 멀리 있는 형제보다 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고 하여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현재는 이웃 간의

소통단절은 물론이고 이웃 간의 갈등도 심화되어 말싸움, 난투극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한' 선진화로 가기 위한 나눔의 실천을 가까이 있는 '이웃과의 웃음가득 인사 나눔' 캠페인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옆에 있는 이웃과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인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인사를 나누는 것은 어쩌면 간단하지만 용기를 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밝은 얼굴로 이웃과 인사를 나누다보면 서로 마음을 열고 때로는 소통과 정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은 나눔의 실천이지만 이웃 간의 인사 나눔이 틀어진 이웃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의 웃음가득 인사 나눔' 캠페인을 활성화 시킨다면 우리 사회 문제인 계층 간의 갈등도 해소하며 나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착한' 선진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⑤ 손재정(고려대학교 중국학부)



한국경제는 저성장 속 분배의 양극화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포용적 자본주의와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공동체 의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가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가 공유가치의 창출을 통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모든 계층이 함께 하는 착한 선진화 : 실천방안'을 주제로 제 10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양병무 교수는 공유가치창출 정신을 기업 내부의 경영자와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외계층, 기업과 교육 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착한 선진화의 실천방안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영은 투명한 유리잔과 같이

그는 "기업의 경영자는 선비정신으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청년 1 명 더 고용하기 운동'에 참여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노사정(勞使政)이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철학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유가치창출 정신은 경제주체와 각 분야에 확산되어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과 공감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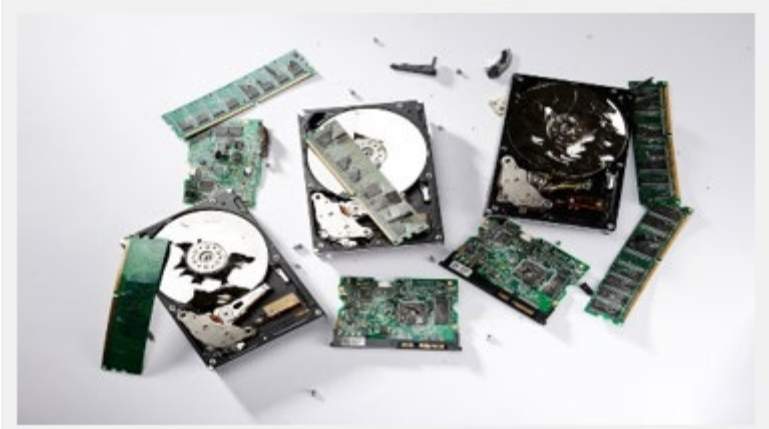

민주화와 산업화는 마차의 앞바퀴, 뒷바퀴

"각 분야에서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착한 선진화를 구축하면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를 동시에 이룩한 품격 있는 나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인 김성국 교수는 "실질노동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실질임금은 꾸준히 감소하는 문제, 기술혁신이 진행될수록 중간층은 더욱 무너져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 현존하는 모든 직업 중 47%가 향후 20 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7 세 아이들 65%는 미래에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노동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드는 파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괴는 혁신의 근본입니다

특히, "국가선진화를 위한 한국기업과 사회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을 통해 산업을 재편하고 고용시장과 노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4 차 산업혁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인 "이영옥 교수는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사회는 나눔의 정신이 연결망으로 체계화될 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운 사람들의 유족들을 지극히 보살피는 것이 다 함께 하는 선진화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착한' 선진사회는 각 개인이 스스로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임무 및 의무에 충실할 때 이루어지며, 어느 여건 하에서도 잘 산다 혹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선진적 감각과 감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상다리가 튼튼하듯 중산층이 튼튼해야

이어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갖춘 사회 엘리트 교육과 상식을 갖춘 건전한 중산층 양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가치의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2013 년을 기준으로 하여 남성의 임금을 1 로 둘 때, 여성의 임금은 0.64 로 측정되어 매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여성 사원에 대한 기업 내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 역시 남성에 못지 않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더욱 뛰어난 자질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사내에서 남녀 서로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직무 영역을 세분화하여 적합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남녀가 서로를 충분히 인정하는 상황에서 직무의 효율성이 발휘되고 임금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⑥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한국경제는 저성장 속 분배의 양극화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은 현재의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함께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5 월 26 일(목)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10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양병무 교수는 공유가치창출 정신을 기업 내부의 경영자와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외계층, 기업과 교육 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착한 선진화의 실천방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경영자는 선비정신으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 1 명 더 고용하기 운동'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노사정(勞使政)이 참여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철학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유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가치창출 정신을 경제주체와 각 분야에 확산하여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상생, 공존, 공감의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착한 선진화를 구축하면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동시에 이룬 품격있는 나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론자인 김성국 교수는 “실질노동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실질임금은 꾸준히 감소하고, 기술혁신이 진행될수록 중간층은 더욱 무너져 양극화가 심화되며, 현존하는 모든 직업 중 47%가 향후 20 년 이내에 소멸한다는 ‘노동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드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가 선진화를 위한 한국기업과 사회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을 통해 산업을 재편하고 고용시장과 노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4 차 산업혁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해야 합니다.

토론자인 “이영옥 교수는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사회는 나눔의 정신이 연결망으로 체계화될 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운 사람들의 유족들을 지극히 보살피는 것이 다 함께 하는 선진화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착한’ 선진사회는 각 개인이 스스로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임무 및 의무에 충실할

때 이루어지며, 어느 여건 하에서도 잘 산다 혹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선진적 감각과 감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갖춘 사회 엘리트 교육과 상식을 갖춘 건전한 중산층 양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진사회는 가진 자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 4 차 산업혁명과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들어서면서 부는 재능 있는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착한'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나눔 문화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첫째로 나눔 문화 확산을 정부가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명예의 전당 회원"처럼 기부에 앞장선 사람들을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또 언론사들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회에 환원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 대국회는 기부자들의 세금감면이나 증여세 인하를 검토하고 국민적 눈높이 맞게 법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정부는 재산만이 아닌 교육, 재능 등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흔히 나눔이라고 하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관념을 깨고 전 국민이 주는 사람이며 동시에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하여 자신이 '소외된 계층' 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게 해야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 나눔 문화의 확산이 분배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성장도 독려하여 모든 계층이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⑦ 이승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모두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세계적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분배의 양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충분한 정신적 바탕 없이 물질적인 경제 발전에만 치중하다 보니 사회갈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10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발제자인 양병무 교수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중산층 감소와 청년실업문제로 인한 분배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21 세기 세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과 세대 간 양극화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CSV: 공유가치 창출

이어서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착한 선진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내부에서는 투명·윤리경영 실천과 임금격차 개선, 청소년의무고용할당제 시행을 제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통해 공유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인 김성국 교수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동안 없던 제품을 만들어 내는 '파괴적 혁신'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혁신이 존재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옥 교수는 모든 계층이 이루는 '착한' 선진사회는 가진 자가 자신의 것을 나누는 데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남보다 많이 가진 무언가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방안: 기부

이와 같이 모두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배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기부 활성화와 기부문화의 성숙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장 자본주의 국가답다는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성공한 기업인들이 공익법인에 거액을 기부해 많은 사회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5% 이상의 주식 기부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증여세법의 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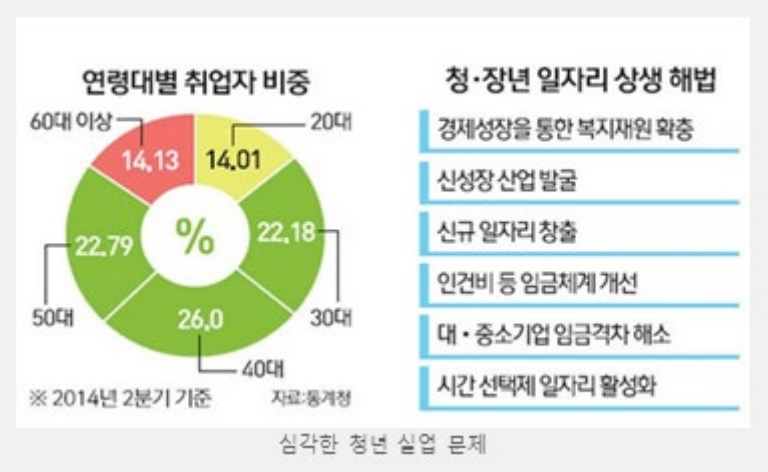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 임금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최근 5 년간 일자리 창출의 89%에 기여했지만, 2009 년에 61.4% 수준이던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 수준은 지난해 60.6%로 낮아졌습니다.

즉,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의 붕괴는 한국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기업 부당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도 중요하며, 중소기업 스스로도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출산, 육아 휴직이나 정시 퇴근,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수준의 연봉 등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청년실업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의 문제로 확산되어 '세대 갈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2: 한경비즈니스
3: http://cafe.naver.com/momandbabys/7242
4; 연합뉴스
5: 서울경제

⑧ 이재환(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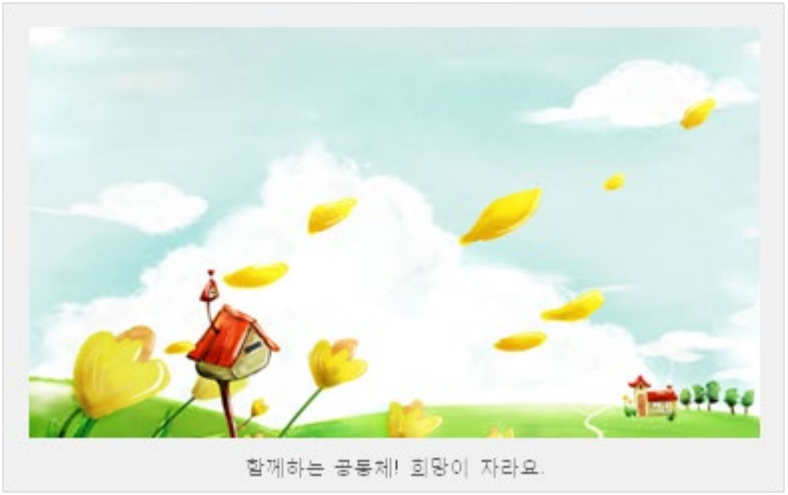
따뜻한 마음으로부터의 착한 선진화

한국경제는 저성장 속 분배의 양극화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이 5 월 26 일(목)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10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양병무 교수는 공유가치창출 정신을 기업 내부의 경영자와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외계층, 기업과 교육 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착한 선진화의 실천방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경영자는 선비정신으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 1 명 더 고용하기 운동'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노사정(勞使政)이 참여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철학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론자인 김성국 교원대 교수는 한국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 부족, 대기업의 침탈 행위가 공유가치창출(CSV)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사회는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며 4 차 산업 혁명 속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희망이 자라요.

토론자인 이영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착한' 선진화를 '모두가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진화로 정의하고, 정치의 합리화를 위한 유권자 운동, 정부 부처 효율성 증대, 상속세와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 환원 활성화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산층을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쪽에 있는 예의가 좋고 바른 나라라는 뜻인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 아시나요? 바로 과거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양보하고 나누어주며 서로를 도와주고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회 양극화 현상은 극에 달아 있고 각종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차이는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고 하위계층의 불만족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계층 간의 격차는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계층 간의 격차는 항상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날 그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계층 간의 단절 때문이 아닐까요? 다 같이 못사는 세상에서는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보다는 '다 같이 잘 살자' 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격차로 발생한 현재 양극화 시대에서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소통은 거의 단절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갑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눔과 소통' 입니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만들어서 하위계층에게는 '주인의식' 을 갖게하고 서로에 대하여 '감사함'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경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덕과 나눔으로 시작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http://blog.naver.com/lovemom_kr/220616499639

⑨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어떻게 이룰까요?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속, 분배의 양극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사회 갈등문제를 치유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해보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제목 하에 10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성국 이화여대 경영대학장은 "실질노동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실질임금은 꾸준히 감소하는 문제, 기술혁신이 진행될수록 중간층은 더욱 무너져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 현존하는 모든 직업 중 47%가 향후 20 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7 세 아이들 65%는 미래에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노동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드는 파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가선진화를 위한 한국기업과 사회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을 통해 산업을 재편하고 고용시장과 노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4 차 산업혁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사회는 나눔의 정신이 연결망으로 체계화될 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운 사람들의 유족들을 지극히 보살피는 것이 다 함께 하는 선진화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착한 선진화는 각 개인이 스스로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임무 및 의무에 충실할 때 이루어지며, 어느 여건 하에서도 잘 산다 혹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선진적 감각과 감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갖춘 사회 엘리트 교육과 상식을 갖춘 건전한 중산층 양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착한 선진화! - 양병무 재능교육대 교수

양병무 교수는 공유가치창출 정신을 기업 내부의 경영자와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외계층, 기업과 교육 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착한 선진화의 실천방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경영자는 선비정신으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청년 1 명 더 고용하기 운동'에 참여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 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노사정이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철학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유가치창출 정신은 경제주체와 각 분야에 확산되어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과 공감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착한 선진화를 구축하면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를 동시에 이룩한 품격 있는 나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급성장 하던 한국 경제가 최근 저성장국면에 들어섰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 년 간 고속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0 년대 들어서 세계의 성장 국면이 저성장시대로 변모하면서, 대한민국의 고속성장세도 수그러들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대한민국의

2010 년대 잠재성장률을 3%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성장 국면으로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한국의 자본주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모두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분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OECD 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 인구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은, 1998 년 31.43%였으나 2012 년에는 45%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분배의 양극화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악화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2015 년도 IMF 의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IMF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소득계층 20%가 1% 성장할 경우 GDP 성장률은 0.08%감소하는 반면, 하위 소득계층 20%가 1% 성장할 경우 GDP 성장률은 0.38%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낙수효과 이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득양극화와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배의 양극화는 소득분포가 양극단으로 쏠리면서 중산층이 감소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산층도 점차 감소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중간 소득 계층은 2000 년 51.5%였으나 2012 년 45.5%로 감소하여 중산층이 약 11% 감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배의 양극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을까요? ① 정규직과 비정규직,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 ③ 남자와 여자, ④ 중년세대와 청년세대들은 각각 한국 경제구조에서 소득 불평등 약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3 년 고용노동부에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53.5%에 해당하는 임금을,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의 64.1%에 해당하는 임금을,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의 64%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의 지속적인 악화는 청년세대의 빈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글로벌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노동시장으로는 경쟁이 어렵다

이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노동시장이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렬한 노사관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현재와 같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개혁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간혹 노동시장의 개혁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노동시장의 개혁은 실업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로 제공할 수 있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개혁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분배의 양극화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2.6%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같은 업무를 해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쥐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고용의 형태에 상관없이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JOBSHARING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착한 선진화를 이룩해야한다!

또한 노동개혁의 JOB SHARING 은 임금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와 대체근로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소수가 일을 독식하는 체제를 타파하고 JOB SHARING 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개혁을 반기지 않는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오늘날과 같은 globalization 시대에 한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개혁을 통해서 현재 경직되고 왜곡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해소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선진화 한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성장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여 선진한국, 따뜻한 공동체를 하루빨리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⑩ 정승훈(단국대학교 철학과)



자본주의 4.0, 따뜻한 자본주의가 온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분배의 양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충분한 정신적 바탕 없이 물질적인 경제 발전에만 치중하다 보니 사회갈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10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발제자인 양병무 교수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중산층 감소와 청년실업문제로 인한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과 세대 간 양극화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공유가치 창출(CSV)을 통해 착한 선진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내부에서는 투명·윤리경영 실천과 임금격차 개선, 청소년의무고용할당제 시행을 제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통해 공유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SV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자!

다음으로 토론자인 김성국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대기업 주도의 공유가치 창출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옥 교수는 모든 계층이 이루는 '착한' 선진사회는 가진 자가 자신의 것을 나누는 데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남보다 많이 가진 무언가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나눔을 통해 국민행복증진!

우리 사회가 더욱 더 선진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정신 문화적 기반이 있을때야말로 우리 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나눔'으로 '의'를 세우자는 주장에 귀기울여봅시다.

우리나라는 향약과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살아온 사회입니다. 두레와 품앗이를 하며 어려운 일들을 서로 도왔고 경주 최부자집은 300 년 전통의 부자가 된 비결로 '나눔'을 꼽습니다. 이런 전통문화적 유산을 복원해야 합니다.



꼭 물질적으로만 나눔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원인 시간, 공간, 재능 등을 기부하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경제계의 재능기부는 굉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이 재능기부란 자신이 남들보다 앞서서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무료로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확산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고품질의 노동생산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남에 비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잘난 부분을 남들과 공유하고 남을 이롭도록 하는 데 쓸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푸르고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대학생들의 재능기부 참여를 독려합니다!

⑪ 조형원(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어렵기만 합니다. 파이가 줄어들면서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사회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실천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도약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포용적 자본주의 정신과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26 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모든 계층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10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양병무 인천재능대 교수는 성장과 분배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저성장으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해결 방안으로 세제 및 교육 변화, 선비정신, 청년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선진화와 기업문화 선진화를 통한 포용적 자본주의와 공유가치창출(CSV)을 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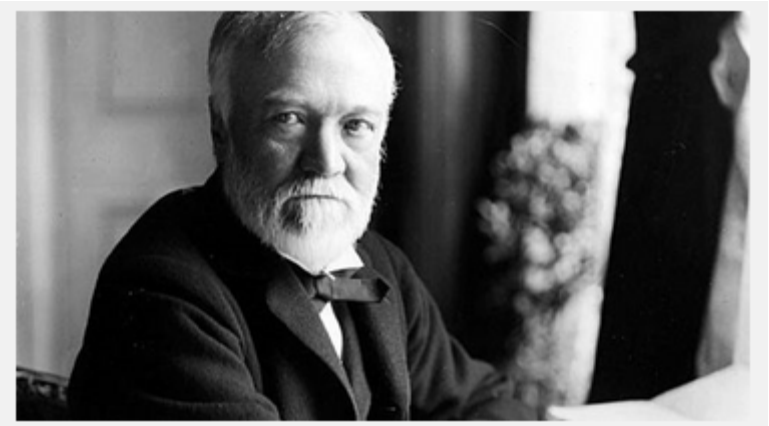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토론자인 김성국 교원대 교수는 한국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 부족, 대기업의 침탈 행위가 공유가치창출(CSV)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사회는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며 4 차 산업 혁명 속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인 이영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착한' 선진화를 '모두가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진화로 정의하고, 정치의 합리화를 위한 유권자 운동, 정부 부처 효율성 증대, 상속세와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 환원 활성화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산층을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선진사회는 가진 자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9 세기 미국의 철강 거부 앤드류 카네기(Andrew Canegie)의 삶으로부터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부는 신의 뜻에 의해 재능있는 소수에게 집중된 것이므로 모든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처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위해 카네기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며 전 재산의 95%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경제적 디딤돌을 제공하고 전국에 2500 여개의 도서관을 세웠으며 카네기 멜론 대학을 세워 저소득층의 교육을 위해 헌신했지요.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카네기처럼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눔의 정신을 연결망으로 체계화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통문화와 종교를 활용한 정신문화 활성화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 나눔 문화와 선비 정신, 기독교의 이웃 사랑, 불교의 자비 정신을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나눔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입니다. 서구 선진국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면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도 확산시켰기에 카네기 같은 기부천사가 등장했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검소와 나눔, 이웃사랑의 정신과 물질문명을 결합한다면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가치창출(CSV)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빈부격차가 줄어드며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통문화와 종교의 정신을 살려 공유가치창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정책 하나를 잘만든다고 하루아침에 나눔의 정신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쉬운 방안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SNS 에 칭찬해주세요" 운동입니다.

이웃을 둘러보며 소소하고 작지만, 아름다운 나눔의 장면을 하루에 하나씩 찾아 주세요.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에 글을 올리고 하루 한 번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한 사람이 뿌듯함과 사랑을 느끼게 해 주세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세상에 눈에 띄게 해 주세요.

사실 선진 사회를 만드는 길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기업의 크고 작은 선행을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 그로 인해 공동체를 위해 임무를 다하고, 자발적으로 나누고 노력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부터 실천해 주세요. 우리 마음 속에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풍요가 가득차 있을 테니까요.

사진 1 출처: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aZby&articleno=1055
사진 2 출처: http://www.gycitize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4 광양시민신문
사진 4 출처:
http://searchingforyoursoul.tistory.com/entry/%EC%B9%AD%EC%B0%AC%EC%97%90%EB%8F%84-%EA%B8%B0%EC%88%A0%EC%9D%B4-%EC%9E%88%EB%8B%A4-%EC%B9%AD%EC%B0%AC%ED%95%98%EA%B8%B0-%EC%A0%84%EC%97%90-%EC%9A%95%EC%9D%84-%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⑫ 주아람(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

저출산·고령화의 고착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로부터 벗어나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26 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모든 계층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10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재능대학 회계 경영과 양병무 교수는 소득 불평등 악화와 양극화를 벗어나기 위한 한국 자본주의의 과제로 공유가치창출(CSV)와 포용적 자본주의에 기초를 둔 기업의 윤리 경영과 노동 개혁, 조직 문화의 개선 과제, 세금과 교육 부문에서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는 선비 정신과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가지고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에 힘써야 하고, 성과 공유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하며, 사회적 공헌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에 힘써야 하고, 교육에서는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성국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통해 혁신을 잘 이끌어내어 앞으로의 4 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영옥 교수는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각 개인이 스스로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임무 및 의무에 충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평등사회라고 주장하면서 나눔을 통해 '의'가 바로 선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로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 감소와 영세 서비스, 자영업 비중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1992 년 50%에서 2011 년 70%로 약 1700 만 명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늘어났지만 생산성의 증가는 제조업 대비 45%로 그쳤습니다.

이렇듯, 수익성이 낮은 부문에서의 현저한 고용 증가는 불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낳았고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정규직의 확산과 경직적인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은 우리나라 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이었던 조선과 해운 업계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에서도 볼 수 있듯, 철강,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생산성 악화와 침체에 대해 기업들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들은 기업의 경영상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경영 정상화와 실적 개선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골든 타임(golden time)이 한참 지난 후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개선 방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산업 부문의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는 비효율적인 조직 문화와 관행들에서도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조직 내부의 문화는 사업장의 분위기와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되어 사실상 기업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침체와 부진은 과도한 연장 근로, 일방적 소통에 익숙한 군대식 문화로 인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근무 형태의 지나친 경직성과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경영 방식 등의 비효율적인 조직 문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기업 문화는 근로 시간 단축과, 회식 문화의 개선, 양성 평등, 원활한 소통을 통한 창의성과 혁신의 도모, 가족 친화적이고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업 조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직 문화와 같은 개선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과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조직 내부의 변화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경영진의 대대적인 지원과 직원 교육 및 연수 등의 뒷받침 속에서 직원들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직 내부 문화 개선을 선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조직 문화 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이에 따라 고용이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 잠재 성장률도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⑬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2 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세계 10 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최근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으로 사회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끔찍한 사회 범죄들이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쌓인 결과가 아닐까요?

양극화가 확대되는 동시에 27 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갈등수준 때문에 1 인당 GDP 의 27%를 갈등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갈등 때문에 치러야할 경제 비용은 연 82 조~246 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과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임금격차 확대는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더욱 사회에 대한 불만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뒤에도 경직된 조직문화는 청년들의 행복지수를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각박한 사회를 밝게 만들어줄 해답은 '공유가치창출(CSV)'이다.

이렇게 피폐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자라날 세대들과 청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으로 공유가치창출(CSV)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CSV 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화두인 공유가치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인 홍익인간, 선비정신 등의 공동체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CSV 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며 국민들에게 큰 거부감이 없이 다가옵니다.

공유가치창출을 위해서 우리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예의를 갖추며 감사함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소박한 제안을 해보려 합니다. 바로 'SNS 을 통해서 매일 아름답고 감사한 사연을 공유하는 운동'입니다.



SNS을 통해 매일 아름답고 감사한 사연을 공유하면 어떨까요?

SNS 가 갖는 파급력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SNS 를 통해 우리가 매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나씩 간단하게 기록해서 이를 공유한다면 많은 이들이 감명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쁜 것에만 반사하고 좋은 것과 감사한 것에는 둔감한 편입니다.

미디어에 매일 올라오는 우울한 사건들만 매일 보면서 정서가 메말라가면서 불만만 쌓아갑니다. 나쁜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만 보는 이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과 아름다움을 매일 접하고 이에 집중하는 눈을 갖는다면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을 공유함으로써 이를 읽는 사람들은 평소 미처 생각 못한 누군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감사한 일을 직접 쓰기가 어렵다면 누군가의 아름다운 사연을 올리는 것 또한 이 운동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 우리는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인성교육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사람들이 갖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넘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를 매일 접하면서 메말라가는 정서가 다시 긍정적이며 밝게 변할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으로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매일 아름답고 감사한 사연을 SNS 에 공유하는 것은 어떤가요?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모두 함께 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권순형(서울대 경제 3) :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성장 잠재력과 사회 역동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계층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상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0 년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은 27 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심합니다.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저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운 사람들을 잘 대우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진사회일수록 국가와 공동체에 공을 세운 이들을 잘 대우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풍요롭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운 이들이 홀대받는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젊은이들은 자신의 나라를 부끄러워하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태도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선 6.25 참전용사 분들의 참전수당을 현실화하여 이들이 빈곤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라를 구한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주워 살아가는 참전용사, 그들은 잊혀진 영웅입니다

김진현(서울대 경제 3) :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2010 년 보훈교육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25 참전용사 중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전수당은 매월 18 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 분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힘들게 사는 모습에 울컥하면서 화도 나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김원빈(서울대 경영 4) :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참전수당을 크게 인상할 만큼 우리나라의 예산 상황이 괜찮을까요? 실제로 정부가 참전수당을 크게 올리지 못하는 근거가 예산상의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현(서울대 경제 3) :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는 15 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전수당을 월 18 만 원에서 60 만 원으로 올린다면 연간 7500 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참전용사들의 고령화로 매년 1~2 만 명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 천안문 광장에 있는 인민영웅기념비

권순형(서울대 경제 3) : 생각보다 참전용사 분들을 제대로 대우해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군요!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대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 의(義)를 세운 분들을 기리기 위해 도심 곳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념공원을 설립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를 통해 평소에도 이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배근표(서울대 경제 3) : 동의합니다. 저번에 중국 여행을 갔는데, 천안문 광장에 들렀다가 공산주의 혁명을 기리는 인민영웅기념비를 본 기억이 납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천안문 광장에 들렀다가 자연스럽게 인민영웅기념비를 보고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거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심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상징물을 보기 힘듭니다. 평소에 현충원에 들를 일은 없고, 그나마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은 너무 작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와 6.25 참전용사들의 동상도 있다면 좋겠습니다.



청계천을 산책하며, 의를 세운 이들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송수혁(서울대 경제 4) : 청계천에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하천 양쪽이 벽돌로 되어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운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벽에 부조로 새겨 넣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청계천을 거닐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원빈(서울대 경영 4) : 요즘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에 딱 맞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제안은 너무 서울에 치우쳐진 것 같습니다. 지방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기념공원 등을 만드는 것은 효과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적합합니다. 저는 지방의 학교, 공연장 등에서 의(義)를 세운 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순회공연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안중근 의사, 6.25 전쟁 등을 다룬 뮤지컬이 공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뮤지컬이 지방을 돌아다니며 공연하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젊은이들

권순형(서울대 경제 3) : 좋은 제안들입니다. 요즘 국가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다보면 사람들이 다시 국가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제안합니다. 군복무를 하는 모든 젊은이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대우와 부조리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군복무가 끝나면 국가에 환멸을 느낍니다. 이래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뭉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성원(서울대 심리 3) :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갈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병들의 피로도가 만성 C 형 간염 환자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젊은이들은 힘이 쭉쭉 빠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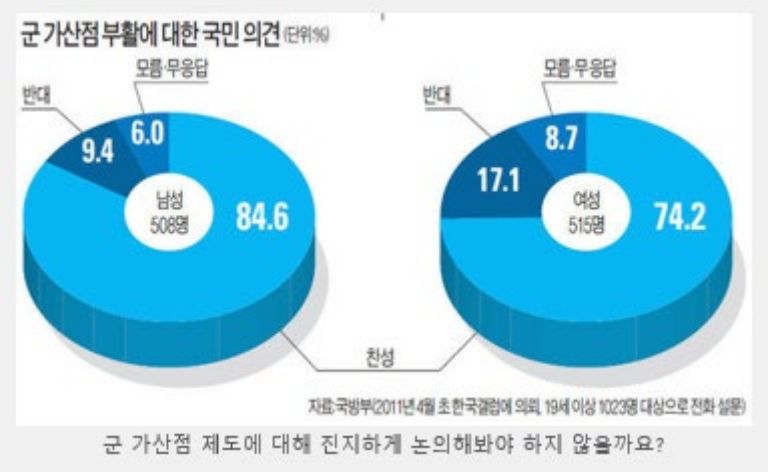
2 년의 청춘을 나라를 위해 바친다면, 최소한 몸과 마음은 온전한 채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군병원에 더 많은 민간 의료진을 투입하여 다친 병사들이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제초, 제설, 세차, 행사동원, 과도한 청소 작업 등 불필요한 사역을 줄여야 합니다. 병사들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것은 하루 8 시간 근무를 한 뒤, 쉬지도 못한 채 수많은 사역에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근무가 끝난 뒤에는 병사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 공부를 하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복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세정(서울대 경제 3) : 저는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대는 가장 학습능력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 중 2 년을 군대에서 보내는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젊은 남성들은 군복무 2 년으로 인해 사회 진출에 뒤쳐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휴학하는 것,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 교환학생을 가는 것 등에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희생한 2 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권순형(서울대 경제 3) :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의(義)를 세운 이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고 나만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6.25 참전용사의 참전수당을 현실화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독립운동가, 참전용사 등의 동상을 만들고 청계천의 벽에 이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부조를 새기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義)를 세운 이들에 대한 지방순회공연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병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군병원에 더 많은 민간 의료진을 투입하고, 불필요한 사역은 합리화해야 할 것입니다. 복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군 가산점 부활도 논의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남성과 여성은 함께 가야 합니다

손재정(고려대학교 중국학부 3 학년) : '대한민국 국민이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를 두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토론을 진행하려 합니다. 대학생들의 토론주제는 '남녀 간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소하여 가치공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자의 직무영역을 세분화시켜 임무의 영역과 임금의 영역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각자 찬반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이민영(고려대 전자공학부 2 학년) : 남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내에서 여성 사원들이 배려받고 좀 더 보살핌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녀 사이에서 당당한 독립적 주체로 서야 합니다.

김성원(고려대 전자공학부 2 학년) :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찬성합니다. 아무래도 여성 사원들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월경 휴가, 육아 휴가 등을 챙겨주기가 회사 입장에서 힘들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등의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해서 여성 구직자를 기피하고 봉급을 적게 주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급을 적정하게 받으려면?

이준혁(고려대 공공행정학부 1 학년) : 제 생각에는 여성이 임금을 많이 받으려면 일을 남성과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직무 능률성이 높지 않다고 여겨지는 인력에 대해 봉급을 적게 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남자는 일단 힘이 세고 특히 군대를 갔다 온 분은 인내력도 강하고 군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군필자를 높게 평가하고 마라톤 완주 증명서를 좋게 보는 것이 아닌가요. 여성도 남성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최성종(고려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1 학년) : 저도 동의합니다. 노력없이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간 임금 격차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은 서로의 지속적인 소통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소통과 합의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손재정(고려대 중국학부 3 학년) : 네. 소통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데에 적극 찬성합니다. 남녀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직무능력, 임무영역을 구획지어 적절히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각기 잘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인재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남녀의 직무를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여 남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영우(고려대 경제학부 1 학년) : 남녀 직원 간 인식을 긍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사내 교류를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게 되면 기업 내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되고, 기업 효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손재정(고려대 중국학부 3 학년) : 이상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배의 양극화 해결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이승현(고려대 경제 3):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 2008 년 세계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전세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장기적 경기침체를 있으며, 우리나라도 저성장과 분배의 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조로의 전환과,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장 불균형 해소 및 대기업 부당행위 처벌 강화 등 중소기업 위주로의 정책 재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연(고려대 영문 2):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에 치우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은 대기업의 3 분의 1 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데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모순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해 경제를 살리자

기술력과 고용환경이 우수한 강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서, 더 이상 대기업만으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조유정(고려대 경영 3):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독일처럼 산업기술력이 우수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강소기업이 많고 체계적인 직업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업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많다는 점입니다.

독일 중소기업들은 독일 고용의 78.7%, 직업훈련의 83%를 담당할 정도로 산업과 정치·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많아지려면 우리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기술력과 독자적인 브랜드 제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 카를벤츠직업학교 자동차실습실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며, 체계적인 직업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또 유능한 인재에는 그에 적합한 대우를 해 주고 근로자를 위한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심진수(고려대 미디어 3): 저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조를 위해서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소득불평등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을 악화시키는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린 영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아직까지 눈에 띄는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조정하여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뿐 아니라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지원(고려대 경제 3): 저는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교육의 양극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지출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저소득층 자녀는 교육 기회와 교육의 질에 있어 큰 차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 차별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선택과 사회활동에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가 사회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인식 하에 저소득가정 학생들도 어엿한 학교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차원에서 이들의 교육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의 양극화 해결을 통해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간 차원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한 대기업이 교육환경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작한 '드림클래스'가 그 모델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대학생을 강사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며, 배움의 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중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승현(고려대 경제 3): 분배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강소기업의 발전을 돕고, 임금격차를 줄이며, 근본적 문제인 교육의 양극화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출처
2: http://blog.naver.com/asdf4236/220242165555
3: 부산일보
4: 연합뉴스
5: http://blog.naver.com/mighty153/220325753258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분배의 양극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주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4 차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연구모임에 참가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년 간 고속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0 년대 들어서 세계의 성장 국면이 저성장시대로 변모하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저성장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대한민국의 2010 년대 잠재성장률을 3%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성장 국면으로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한국의 자본주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모두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분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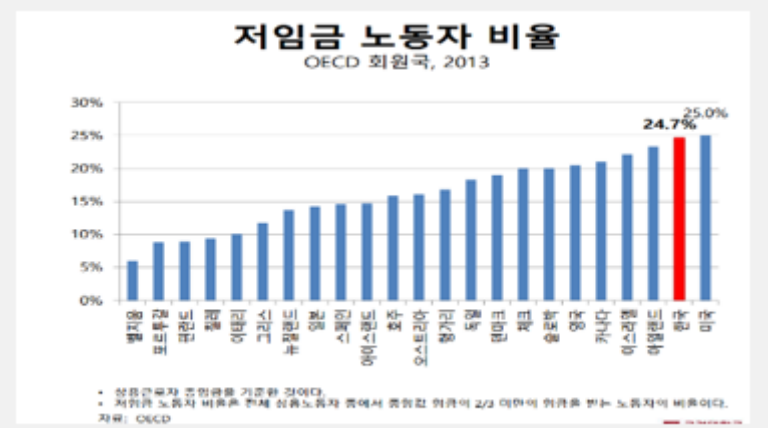
더 이상 낙수효과는 유효하지 않은 이론이다.

2015 년 IMF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더 이상 부유층의 투자 · 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인 낙수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즉, 분배의 양극화는 방치해서는 안 되고, 분배의 양극화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노동시장이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렬한 노사관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현재와 같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개혁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간혹 노동시장의 개혁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노동시장의 개혁은 실업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로 제공할 수 있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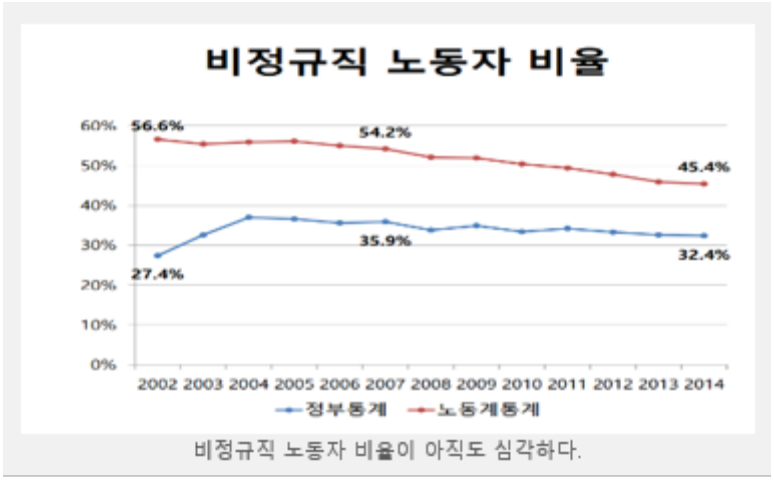
권원중(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저도 분배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평소에 뉴스를 보면 분배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방금 말씀해주신, 2015 년의 IMF 연구결과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가장 심각하다.

제가 최근 수업에서 들은 것인데,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1998 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중앙값 임금의 2/3 도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분배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자현(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맞습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2015 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54.4%이고, 전체 노동자 수의 32.4%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같은 일을 하고도, 혹은 비정규직이 더 힘든 일을 하고도, 낮은 임금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아직도 심각하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왜곡된 노동시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 혹은 더 어려운 일을 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다른 한 쪽을 착취하여 일자리를 유지하는 현상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현민(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분배의 양극화 심각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지만,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해 세대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15~29 세의 청년실업률은 2016 년 모두 10%를 넘겼습니다.

높은 실업률로 인한 청년 실업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실업자들뿐만 아니라 취업자들도 문제에 처해있습니다. 앞서 정석환 학우가 말해준, 비정규직 문제도 청년 취업자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을 헤쳐나가 취업을 간신히 한다고 해도, 청년들의 대다수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정석환 학우의 수치처럼 취업을 한다고 해도 정규직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임금 때문에 분배의 양극화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차준용(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앞의 학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동시장이 정말 왜곡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학을 배운 입장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각종 비합리적인 인식이나 제도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면 사회 전체 효용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곡된 시장을 해결하고 사회 전체 효용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할 텐데,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노동시장에 관한 여론은 현재 좋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노동시장 개혁의 이미지는 '쉬운 해고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악'입니다.

왜곡된 관점에서 보자면 쉬운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를 당하고 있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해고도 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회사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악덕 사용자에 의해 노동개혁의 내용이 악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밀한 입법을 통해서 이를 조정해야지, 이 때문에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똥이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그는 모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같이 상생하기 위해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합니다.

정영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노동개혁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쟁점적인 법안이나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론의 형성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여론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는 키워드로 반대한다.

그러나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쪽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감성을 자극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악', '쉬운 해고 만드는 노동개혁' 등의 키워드는 모두 반대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몰이에 맞서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쪽도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긴 줄글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눈에 띄고 머리에 새겨지는 키워드를 통해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인식개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매우 동감합니다. 인식개혁운동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노동개혁을 이루어내,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극렬한 노사관계를 해결한다면 대한민국은 다 같이 성장하는 선진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분배의 양극화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개혁의 JOB SHARING 은 임금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와 대체근로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소수가 일을 독식하는 체제를 타파하고 JOB SHARING 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Globalization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앞에서 학우들께서 언급해주셨듯이 노동개혁을 반기지 않는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오늘날과 같은 globalization 시대에 한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개혁을 통해서 현재 경직되고 왜곡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해소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토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은 다른 학우와도 토론하여 울림이 되어 널리 퍼지도록 합시다. 분배의 양극화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한국이 착한 선진화를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우리사회에 팽배한 반기업정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김한슬(정외 3): 안녕하십니까?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는 저성장 속 분배의 양극화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14 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가 10 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이는 상당 부분 기업의 횡령과 탈세 등 부정과 불법에 기인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러한 반기업정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양산의 요인일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기업 정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기업정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기업이 공유가치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조재환(경제 2): 공유가치창출의 경우 대기업에서 앞장서서 해나가는 것이 더 홍보도 잘 되고 성공가능성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유가치창출 자체가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아무래도 수익모델으로서의 경쟁력이 엄청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카카오택시의 경우 기존의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기존 콜택시의 높은 가격, 콜택시 업체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많은 것 등)을 해결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도 카카오가 대기업 반열이었기 때문에 시도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슬(정외 3):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이, 사실 반기업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주체가 대부분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공유가치창출에 나선다면 반기업 정서 해결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사학 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아직 여유가 부족하니까 당장 회사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 수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도 대기업 위주로 국가 정책도 만들어져왔고 그로 인해 대기업이 많은 수혜를 받았으니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다윤(정외 2): 저도 동의합니다. 시장 자본을 대기업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니까 반기업 정서가 더 심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처럼 사회에서 많은 수익을 얻은 대기업이 사회에 그 이익을 환원할 수 있게 공유가치창출에 기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주현(정외 2): 저는 대기업이 공유가치창출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평등한 노동구조가 반기업정서에 일조하는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공유가치창출만 하면 오히려 역효과로 대기업이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는 등의 부정적 인식만 낳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 자본의 탐욕성을 보여준 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에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건,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재벌들의 무책임한 모습,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당장 떠오르는 예인데요.

생명, 안전보다는 돈과 효용만을 중시하는 문화, 이윤을 위해서 희생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실직되면 당장 생계가 휘청거리는 취약한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지금의 이런 굳건한 반기업정서가 만들어졌고, 자본은 결국 이기적인 속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고, 노동이사제와 같이 노동자가 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시스템 개선, 경영의 투명성 보장 등 불평등한 노동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란 결국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 과정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규제(사회적 안전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필요합니다.

김지수(사학 2): 우선은 그것도 맞는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반기업정서에는 정책적으로 대기업을 우선 살린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기업들의 '국가경제기여'에 100 점 만점에 46 점을 주었는데요,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낮은 기업들에 세금을 쓴다는 것에 납세자로서 국민들은 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갑질행위 등 비윤리경영에 대한 기업, 소비자, 정부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방주현(정외 2): 맞습니다. 게다가 재벌들의 갑질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반기업정서가 더욱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재별이 3 세, 4 세까지 내려오면서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은 떨어지고, 그것이 자기가 받은 특권인 것 마냥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 회장의 성추행 파문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니, 재벌과 기업 총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김한슬(정외 3): 그러한 소수의 행위로 인해 기업 전체에 대한 반감이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갑질이나 범죄를 저지른 재벌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아직도 강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소비자들도 이번에 옥시사태처럼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운동을 통해 윤리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을 혼쭐을 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도덕적 성숙은 개인의 노력의 문제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윤리경영이 이윤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윤리경영을 하지 않을까요?

이다윤(정외 2): 맞습니다. 개인적인 인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들에게 믿음을 걸어보는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시민의 힘을 보여주고 정부에서도 비윤리경영이나 갑질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한다면 반기업정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 기업도 시민들의 불매운동으로 1 위자리를 M 에 넘겨줬지 않습니까?

김한슬(정외 3): 여러분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반기업정서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앞장서서 공유가치창출을 실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 등 불평등한 노동구조 개선과 더불어 노동개혁을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안전망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갑질논란 등 기업과 기업인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반기업정서에 일조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업 자체에서도 윤리경영과 도덕적 성숙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시민들은 사회운동 등을 통해 비윤리적인 기업에 책임을 묻고, 정부는 이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쌓기도 힘들지만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고 오히려 반감이 높아져가는 이 시점에 기업은 '윤리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이 배치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윤리경영과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1: segye.com
2: news.donga.com
4: hankookilbo.com



조형원 (연대 식품영양 4): 지금부터 제 4 차 서울지역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공유가치창출(CSV) 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공유가치창출(CSV)이란 사회적 약자와 함께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고 이를 공유하는 상생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유가치창출은 경제적 이익 또한 함께 추구하므로 사회공헌활동(CSR)보다 사회 전체에 더 빠르게 널리 확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유가치창출은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경제침체가 일상화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가치창출이 확산되면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고 공동체 정신이 확립됨으로써 갈등 비용이 감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유가치창출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저는 공유가치창출을 위해서 '하루 한 번 좋아요' 운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SNS 상에서 기업과 이웃이 이기심을 넘어서서 공유가치를 창출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칭찬한다면 공유가치창출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는 공유가치창출에 효과적입니다

김영철 (고려대 영어번역 4): 조형원 학우가 말씀하신 SNS 상에서의 '하루 한 번 좋아요 운동'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공익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하는데요.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생산한 상품을 유통하는 사회적 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하고 판매 경로를 제공한 후 수익을 나눠가진다면 공유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PC의 착한 빵은 농촌과 협업해 공유가치를 창출한 좋은 사례입니다

이교신 (서울시립대 경영 4): 김영철 학우가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경우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상품가치는 우수하지만 전달력과 표현력이 부족해 판매량이 적은 중소기업의 상품판매를 대기업이 도와주는 것이 공유가치창출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홈쇼핑 채널, 대형마트, 편의점, 물류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우수한 판매 경로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매출이 올라가면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양극화 해소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지현 (서강대 도시계획 4): 이교신 학우의 말씀대로 기업이 공유가치 창출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또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CJ 가 베트남에서 새마을운동을 시행한 결과 현지 농민은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CJ 는 그들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현지에서의 기업 이미지도 크게 향상시켜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처럼 기업이 농촌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촌의 취약계층이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게 돕는다면 공유가치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은 우수농산물을 판매함으로서 수익도 얻고 홍보효과도 누릴 것입니다.



노인-대학생 홈쉐어링을 통해 시민 간에도 공유가치창출이 가능합니다

배우리 (경희대 외식경영 3): 앞에서는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 시민들도 공유가치창출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독하게 사시는 노인분들의 집을 개조해서 대학생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게 하는 홈쉐어링이 좋은 예입니다. 노인분들은 소소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대학생들은 주거비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한 시골마을의 이야기도 좋은 사례인데요. 주민들이 마을로 통하는 삭막한 국도에 예쁜 꽃을 일제히 심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며 잠시 멈추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식당과 상품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가치창출이 활성화되어 시민과 사회가 이익을 얻는 사례들이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다면 공유가치창출이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 공유가치창출의 좋은 사례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눌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수민 (서강대 경제 4): 공유가치창출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세계의 경우 일정액 이상 쇼핑하면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하여 상생을 추구하기도 했고, 남양유업은 우유배달을 하면서 1 인가구와 노인, 고아 등이 잘 살고 있나 확인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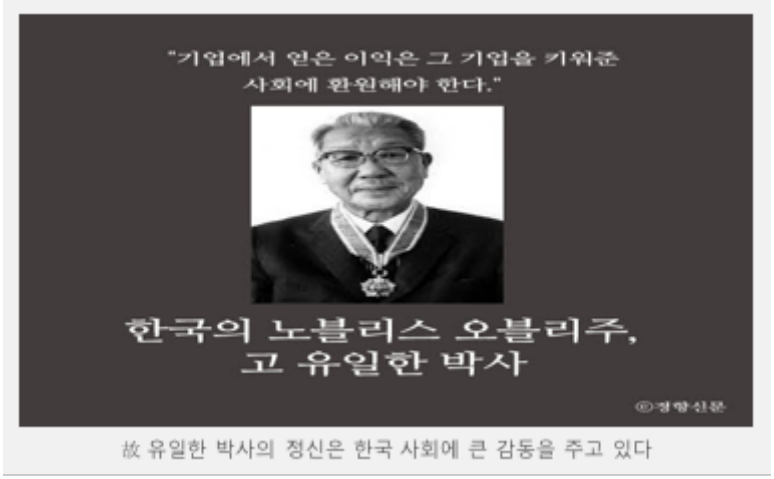
따라서 무엇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받아들일 창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털과 카카오와 페이스북 같은 SNS 회사들, 클라우드펀딩 사이트 등이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플렛폼을 만들고 시민과 기업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형원 (연세대 식품영양 4):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가치 창출 방안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대기업과 농촌의 협력, 시민의 공유가치 창출, 아이디어 수집 창구 제공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유가치창출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풍요 속에서 나눔과 행복의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진 1 출처: 유한킴벌리 http://www.yuhan-kimberly.co.kr/Mobile/Society/Csv
사진 2 출처: 청년포털, 한국사회적기업진행원 블로그 http://bit.ly/1svlXIQ
사진 3 출처: http://bit.ly/1TYldck
사진 4 출처: 헤럴드경제 http://bit.ly/1Y8ebkU
사진 5 출처: http://bit.ly/1VLIPAt

④ 영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故 유일한 박사의 정신은 한국 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김주헌(영남대 국사 4) : 지금부터 영남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와중에도 토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참가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의 주제는 영남대학교 학생들이 제안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방안'입니다.

우리 역사속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존재했습니다. 400 년간 명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실천한 최부자 가문과 유한양행을 설립한 故 유일한 박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제공함고 동시에 이윤의 극대화보다 적정한 이윤을 지키며 신뢰를 얻으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우선 윤리경영을 행하기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방안에 대해서 마음껏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박준용 학우부터 제안해주십시오.



파나소닉의 창립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윤리경영의 신(神)이었다

박준용(영남대 역사 2) :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작은 철물점을 운영을 시작으로 하여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일본의 대기업 중 하나인 '파나소닉'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직원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현한 인물입니다. 1929 년부터 세계 대공황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에도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망해도 직원을 안고 간다는 마인드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정민(영남대 역사 1) :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쟁을 우선시하는 인물들은 보통 경쟁을 통해 성취를 얻게되면 그것이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여 독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함에 있어 사회의 구성원들의 구매가 필수불가결합니다.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큰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업을 다니는 이사들을 비롯한 말단 회사 인턴까지 진정한 기업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업경영에 대한 철학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인들에게도 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경수(영남대 역사 1) : 프랑스나 독일 등의 선진국에 대한 사례를 보면 철학 및 윤리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뛰어난 재능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윤리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혁(영남대 역사 2) : 우리나라 기업이나 공무원들 역시 계급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부작용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땅콩회항'과 같은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갑질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이 큰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타파되어야 윤리경영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경수(영남대 역사 1) : 기업들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세 등의 혜택을 통해 사회적인 환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유업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의 실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정민(영남대 국사 4):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그러나 윤리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경수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냄비근성이 남아있습니다.

'남양유업 대리접 강매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매운동을 펼쳤지만 결국 단기간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불매운동을 펼쳤더라면 윤리경영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확대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이행하면 표창장을 수여하여 명예를 높여주는 등의 활동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수영(영남대 역사 1): 박정민 학우가 말한 남양유업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및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지연(영남대 정치외교 2):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기업들이 부(富)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비롯한 골목상권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손수영(영남대 역사 1):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든든한 중견기업과 강소기업들을 육성하여 실업난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40여 명은 '부자증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주헌(영남대 국사 4) : 또 다른 사례를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정지연(영남대 정치외교 2) : 미국의 경우 지난 2016 년 3 월 뉴욕주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며 '부자증세'를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곳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우리의 몫을 부담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세금을 잘 낼 수 있고 더 많이 낼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는 등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카네기와 록펠러 등의 부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해 설립한 비영리 자선사업재단을 만들었으며, 이는 오늘날 미국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이행과 공헌의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과 카네기 재단은 기아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제 3 세계에 대한 원조 등 많은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슬(영남대 생명공학 1) : 현재 '사회적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 중에서도 한화 '빈스앤베리즈'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대기업 최초로 고용노동부로 부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전국 36 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빈스앤베리즈의 직원들은 아르바이트가 아닌 모두 정규직입니다. 또한 골목 상권과 동반성장을 위해 골목 카페에 운영 노하우와 음료 레시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김주헌(영남대 국사 4) :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인 의식부터 시작하여 교육, 사회적 기업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의 양극화를 최소화시키고 착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빈스앤베리즈와 같은 사례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사진 1 : 경향신문
사진 4 : 연합뉴스
사진 6 : 비즈니스 포스트

⑤ 경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효원(경상대 건축공 4) : 지금부터 경상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 모임에서는 모든 계층이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를 주제로 나눔 정신의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계층 간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 기업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사회의 비교하는 습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궁핍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며 삶에 있어서 여유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착한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가까운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소통하며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이웃과 웃음가득 인사 나눔' 캠페인을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웃과 웃음가득 인사 나눔' 캠페인이 활성화 된다면 이웃과 인사를 나눔으로서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정을 나누면서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계층, 세대 간의 갈등도 해소시키며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바다 부활 운동으로 소통하고 나누자

강효빈(경상대 건축공 4) : 저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 모든 계층이 화합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이라는 인식이 기부나 모금 활동처럼 금전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봉사활동처럼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가능한 것,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물질적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눔은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눔을 주는 상대와 나눔을 받는 상대가 서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 정신의 기본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비록 고도성장과 무한 경쟁의 현실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지만 항상 감사와 배려의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솔미(경상대 건축공 4) : '나눔은 물질적인 나눔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강효빈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눔의 정신을 확산하고 공동체 의식도 회복할 수 있는 '아나바다 부활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바다가 최근에는 플리마켓, 프리마켓, 플프마켓으로 변화되어 지역마다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일종의 벼룩시장과 같은 마켓과 '아나바다 부활운동'이 확산된다면 지역 주민들 간에 안 쓰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거나 사고파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운동을 통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재능을 나누면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공동체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나눔 캠페인 활성화로 나눔 정신 확산하고 사회를 변화 시키자

정다운(경상대 건축공 4) : 저는 이솔미 학우와 생각이 다릅니다. 나눔의 정신을 확산시켜 착한 선진화로 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려면 사회 영향력이 미미한 소규모 나눔보다는 나눔 캠페인을 대규모로 진행시켜 사회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나눔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살린 나눔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눔 재단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을 하고 지속적인 나눔 실천과 캠페인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이 크도록 나눔 정신을 확산시켜 착한 선진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소정(경상대 건축공 4) : 저는 정다운 학우의 의견과 조금 다릅니다. 정다운 학우가 말하는 대규모 나눔 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큰 파급력으로 나눔 정신이 확산될 수 있고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소규모 나눔 운동이 결코 사회에 영향력이 작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김효원 학우가 언급한 플리마켓과 프리마켓 등도 처음에는 소규모로 진행이 되었지만, 반응이 좋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보니 대규모 마켓으로도 성장하기도 하고 많은 지역으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나눔 운동을 활발히 하면서 대규모 나눔 운동도 함께 한다면 더 빠르고 크게 확산되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 캠페인 활성화로 나눔 정신 확산하고 사회를 변화 시키자

심창현(경상대 건축공 4) : 정다운 학우와 강효빈 학우의 의견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모범적인 실천과 공동체 의식 회복을 통해 나눔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으로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인식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지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변화의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 시민운동이 시행되어도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교육을 통해 나눔 정신과 공동체 의식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박소연(경상대 건축공 3) : 저는 심창현 학우의 '인식전환이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나눔을 함께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공익광고처럼 나눔 광고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대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나눔에 대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눔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고 더불어 인식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나눔이라는 것에 마음을 열게 되고 광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원(경상대 건축공 4) : 여러분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소통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꾸준히 나눔 운동과 캠페인을 펼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과 공동체 의식의 회복으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착한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⑥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속 분배의 양극화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함께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선진사회는 가진 자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 4 차 산업혁명과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들어서면서 부는 재능 있는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착한'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로 나눔 문화 확산을 정부가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명예의 전당 회원"처럼 기부에 앞장선 사람들을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또 언론사들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회에 환원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 대국회는 기부자들의 세금감면이나 증여세 인하를 검토하고 국민적 눈높이 맞게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정부는 재산만이 아닌 교육, 재능 등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흔히 나눔이라고 하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관념을 깨고 전 국민이 주는 사람이며 동시에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대학생으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윤상(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1): 저는 오정학 학우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나눔 문화 확산을 정부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부에 앞장선 사람들을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또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사들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세영(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1): 나눔 문화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우선 사회지도층의 선도적인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지도층 나눔 의식이 매우 저조한 국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를 선도하고 책임지는 리더들부터 타의 모법의 될 수 있게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적극 독려해야 합니다.

김호준(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1):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눔이란 자신의 자발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고상한 일이므로 사회 지도층이 나눔 문화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지도층이 나눔을 선도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느낌을 주거나 나눔 본연의 색깔을 퇴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훈(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1): 보다 적극적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환원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 대국회는 기부자들의 세금감면이나 증여세 인하를 검토하고 국민적 눈높이 맞게 법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나눔 문화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곽민석(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1): 저는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부자들의 세금 감면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배의 양극화가 심하여 서민들의 부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자 세금 감면은 자칫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오히려 기부문화 자체의 색깔을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김성빈(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1): 저는 사회적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선 모금기관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나눔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나눔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모금기관의 성금 유용 등으로 인해 나눔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금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장금성(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1): 네 저도 동의합니다. 나눔 기관의 투명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몇 년 전에 한 자선단체에 얼마 간의 돈을 기부하였는데 최근 경찰 수사결과 그 기관이 성금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들에 사용한 대신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나 저희 가정도 허탈하였습니다.

박규식(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1): 정부는 재산만이 아닌 교육, 재능 등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흔히 나눔이라고 하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관념을 깨고 전 국민이 주는 사람이며 동시에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눔 문화 확산해야 합니다.

문남규(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1): 저는 정부가 기부단체 지정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나눔 기관으로 자칭하는 NGO 가 너무 많아 혼란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보다 신중히 해야 합니다.

신종현(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1): 저는 자원봉사센터를 민영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기관을 정부가 운영하면서 일부 경직되거나 비효율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나눔에 접근할 수 있게 자원봉사 센터를 민영화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정해진 딱딱한 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문남규(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1): 저는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나눔 의식이 싹틀 수 있게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전국의 학교들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세계관이 형성될 때 나눔 의식이 마음속에 자리잡아야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자발적 나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나눔의 교육으로 지구촌 공동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오정학 (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1):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하여 자신이 '소외된 계층' 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게 해야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 나눔 문화의 확산이 분배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성장도 독려하여 모든 계층이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⑦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재환(동아대 무역 2) : 지금부터 동아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 모임에서는 계층 간의 갈등 극복과 나눔문화를 주제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층 간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착한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층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도덕과 나눔으로 시작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희수(동아대 무역 1): 저는 무엇보다도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선 하위계층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또는 돈이 많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깔보기보다는 도와주고 기회를 주는 상위계층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는 여기서의 나눔이란 무작정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위계층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음식 배달원, 공사장 일용직 등 모두 사회에 없어선 안 될 직업들입니다. 모두들 인식하고 있지만 직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계층 간의 갈등이 극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진(동아대 무역 3): 저는 상위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땅콩 회항부터 얼마 전에 일어난 미스터피자 갑질까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 저명인사나 소위 상류계층의 '갑질'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상태입니다.

상위계층은 하위계층을 무시하고 하위계층은 반대로 상위계층에 대한 존경보다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헐뜯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계층 갈등을 해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권은혜(동아대 무역 2): 저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우리 사회에 퍼져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국가 지도층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현양하는 훌륭한 전통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영국의 왕들은 18 세기 중엽 조지 2 세 때까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 출정해 귀족들과 함께 진두지휘하는 것을 상례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 공동체를 지키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뿌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상위계층의 병역기피, 원정출산, 비리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정신과는 먼 행보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과거 유교문화의 조선처럼 '윤리'가 중요한 사회로 바뀌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영(동아대 무역 1):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쪽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서로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나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계층이란 것은 존재하고 갈등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나눔'이 어색한 사회입니다. 밑에서부터 더 밑까지 나누어 주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계층 간의 갈등은 극복될 것입니다.

이재환(동아대 무역 2):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은 무엇보다 계층 간의 나눔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모든 계층이 조금의 나눔부터 실천하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착한 선진화'로 나아갈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⑧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정승훈(철학 4): 이른바 '재능기부'가 사회적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험기간인 와중에도 이렇게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나눔의 가치를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개최하겠습니다.

최신 경영의 트렌드는 CSR 과 CSV 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CSV 는 경영성과를 사회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최첨단의 이론인데요. 기업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공유'라는 가치를 장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국대 내에서도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나눔의 가치에 대해 재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총 2 부로 1 부는 청년들이 느끼는 양극화와 청년 실업의 문제점과 각자가 생각하는 그 해결방안으로 진행합니다.

2 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눔을 개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나눔과 기부의 트렌드인 '재능 기부'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꼭 물질적으로만 나눔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원인 시간, 공간, 재능 등을 기부하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경제계의 재능기부는 굉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주소

허슬람(철학 2):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n 포세대라고 하는데 취업이 너무 어려워지다보니 여러가지를 포기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적인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양극화와 청년실업문제는 서로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민(사학 3): 청년들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에서 빈부격차, 빈부격차에서 소득격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자신이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한 좌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타 국가에 비해 크지 않지만 자신의 최소한의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아서 결국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노력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고용률을 높이기보다는 임금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준(철학 2): 우리나라 세대를 생존주의 세대라고 할 만큼 최저시급과 소득격차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을 주장하는 일각의 입장은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중(법학 4): 제가 느꼈던 것은 최저시급이 실질적으로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물가까지 고려했을 때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취업하는 것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경제환경이 제가 어디까지 꿈을 꿀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목(사학 4): 수저계급론이 갖고있는 그 근본적인 의의는 능력주의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기 주변사람들과의 비교로부터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입니다. 주변의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큰 노력없이 성과를 이뤘을 때, 자신을 재평가하고 그 계층의식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임지은(철학 2): 저는 회사들을 보았을 때 근로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고속 성장시대에 노력하다보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었는데 현재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아니면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해온 대기업 집단들

과거에 경제성장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사회적 환원의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들이 잉여자본을 사회에 기부하고 그러한 자금을 토대로 정부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근로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경영 4): 보수정권은 주로 대기업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주장하였고 진보정권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대기업의 돈을 뺏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면 나라의 발전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의문입니다.

낙수효과가 기대와 달리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가계소득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원(사학 4): 사내유보금 800 조원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쓰자는 것은 그 이론적인 바탕이 다소 부족합니다. 낙수효과의 실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원(한문교육 4) : 나눔이라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역시 기업과 정부에 동등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상에 나눔을 더하다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직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윤(도시계획부동산 4):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즐거울 수 있다면 그 나눔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기부의 차원이 아니라 서로 행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우(경영 3): 소득분배, 청년실업 이 모든 것의 문제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능기부가 지금처럼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단순한 전문가에게 의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능기부에도 무상이 아닌 금전적인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교육 역시도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호재(정치외교 3): 교육을 통해서 청년실업을 막는 것은 좋지만 결국 대기업이 계열사를 늘리는 식으로 모두 확장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규제처럼 대기업에 의해 흡수되는 이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허슬람(철학 2): 저는 나눔이라는 것이 강자와 약자를 나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의 주체가 기업이나 개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가 나서서 나눔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민(사학 3): 모든 이념을 떠나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제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우(경영 3): 소수의 기업과 정부는 국가 경쟁력과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와 국민이 반기업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걸고 돈을 회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계열사를 줄이고 경쟁력을 잃게 되었을 때 이러한 영향이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민감하고 그 기준을 설정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파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한정민(사학 3): 한 사회의 존망이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슬람(철학 2):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소수의 정권이 나라의 존망을 결정지었듯이 지금은 자본주의의 프레임 안에서 기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승훈(철학 4):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수저계급론 같은 현시대의 청년진단 담론과 함께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에 대해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나눔에 대한 여러 시각들을 제시하면서, 재능기부에 대한 투자가 인적자본의 재생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양극화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역시 법제나 그 밖의 경제체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나눔에 대한 정신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자유를 향해 뛰박질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⑨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조직의 문화는 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주아람 (건국대 경제학 4) : 지금부터 건국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가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방안들 중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문화의 개선 방안들에 대해 자유로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부문의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는 과도한 연장 근무와 일방적 소통에 익숙한 군대식 문화, 지나친 근무 형태의 경직성,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경영 방식 등의 비효율적인 조직 문화와 관행들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의 문화는 사업장의 분위기와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되어 사실상 기업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경영진들의 직원 교육과 직원 개개인들의 주인의식으로부터 차근차근 조직 내부 문화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맞게 직원과 기업 내부의 역량을 기르자.

김가은 (건국대 경제학 4):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진 조직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야근 문화와 강제적인 회식 참여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이 긴 것이 능사가 아니며 제 시간에 업무를 끝내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기업 내부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식의 경우에는, 직원들 간 친목을 다지고 업무 때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같은 자리를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근무시간의 연장이라 느끼고 피로해 하는 직원들이 허다합니다. 또한 회식으로 인해 가족들과 보낼 저녁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악습입니다.

오재선 (건국대 경제학 4): 강제적인 회식으로 인해 가족들과 보내는 저녁시간이 줄어든다는 김가은 학생의 의견을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가족적인 문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직 문화는 친가족적인 문화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사내 운동회와 행사들을 개최할 때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을 주최한다면, 분명 직원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사기를 높여줄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건강한 직장생활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기업 내에서 친가족적인 행사들이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은서 (건국대 경제학 4): 앞서 두 분께서 비효율적인 야근 문화와 반가족적인 기업문화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점점 더 하나의 거대한 통합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체화하여, 선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화 추세에 맞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에 힘쓰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들과의 직원 연수 프로그램 교류를 활성화하여 항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기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세계화에 맞게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 육성과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추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민희 (건국대 응용통계학 4): 김은서 학생의 말대로,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앞으로는 창의적인 인재가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군대식 문화에만 익숙해진 기존의 경직적인 조직에서는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직 문화도 기존의 수직적인 문화로부터 창의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수평적인 문화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아람 (건국대 경제학 4):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강제적인 회식이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친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과,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흐름을 타고 세계화를 선도하는 기업과 직원들 양성에 힘써야 하며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질적으로 한층 더 향상된 조직문화는 우리의 기업들을 더욱 혁신적이고 생산적으로 탈바꿈시켜 세계화시대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성장과 풍요의 궤도로 끌어올려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연구모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진화 과제 13:

문화유산의 세계화

(제 93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김다혜(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화유산은 행복한 인류사회에 기여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한류 문화가 국제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몇몇 한류 문화는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죠. 이처럼 행복한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우리 세대 청년들의 주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문화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유산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문화유산 확산과 공유 방안을 모색하는 제 93 차 월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작업은 한국의 품격과 정체성을 알리고 인류 문화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임을 보이는 사업이고, 이러한 작업은 문화유산이 생생한 국가의 품격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만든다."라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등재된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고 올바른 활용 및 홍보에 관련한 업무를 체계화시키는 법안의 필요성, 문화유산이 소재한 지자체의 관리 인력 충원, 전문성 확보,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에 토론자 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문화유산을 매개로 해서 국제적인 소통의 길로 가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앞으로 문화유산을 우리 것을 알리는 하나의 그런 세계화, 국제화에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시급한 것은 문화유산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인터넷과 SNS, 즉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세계와 공유하는 일”이라고 강조 했고, 배일환 이화여대 관현악과 교수는 유형문화유산만이 아닌 무형문화유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과 문화의 전통성과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유산의 세계화가 왜 중요할까요?

또한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문화예술에 관심을 쏟으면서 기본을 터득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문화유산의 세계화가 왜 중요할까요?

문화(文化)는 특정 지역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면서 공유하는 의·식·주, 관습, 언어, 예술, 사고방식, 가치관 등과 관련되는 모습을 지칭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소중한 자산이고, 민족과 국가를 대표하는 정체성의 근원인 문화유산은 인류공동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등 세계 문화유산 등재 기준인 ⇒ 걸작품, 문명의 교류, 문화적 전통과 관계된 특출한 증거,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유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2008 년 ‘숭례문 화재사건’처럼 우리는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지만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언어의 해설이 되어있지 않아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올바로 이해하는 기본교육이 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초, 중, 고,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과 평생교육 시설에서 다양한 연령에 눈높이를 맞춘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겠죠.

초, 중, 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대학생들의 MT, 직장인들의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역사유적지, 문화유산이 보존된 장소에서 진행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흙 속에 묻힌 보석도 갈고 닦아야 값어치를 알 수 있듯이 문화유산을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이루는 기초 단계입니다.



문화유산 세계화에 대학생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

특히 높은 수준의 다양한 언어를 습득한 많은 대학생 인재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IT 기술과 SNS 를 통한 광고, 홍보,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앞장선다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마다 역사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겨주고, 역사유적 보관 · 관리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인턴쉽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대학생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문화 자본의 시대입니다. 이런 추이를 비추어 볼 때 문화유산의 세계화는 몇몇 연구사들, 문화애호가들의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돌려야 하는 천년대계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세계화는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계에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인류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알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겠죠. 이를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일반인, 시민 단체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나 자신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② 김수빈(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 93차 월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여러분은 '프랑스'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에펠탑, 개선문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자유의 여신상, '중국'이라고 하면 만리장성이 떠오를 것이구요.

그렇다면 '한국'이라고 할 때 외국인은 곧바로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국보 1 호인 숭례문이나 첨성대, 팔만대장경 등을 떠올릴까요? 아니면 김치 같은 음식이나 K-pop 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없는 듯 합니다.

과연 이는 우리나라에 문화유산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아름다운 고궁을 비롯해 선조들의 지혜가 녹아 있는 유, 무형의 문화유산을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인 지금, 문화유산의 세계화는 필수적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26 일 '문화유산의 선진화'를 주제로 제 9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지자체의 관리 인력 확충, 전문성 확보,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방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중국의 사례를 들며, 문화유산자료를 디지털화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대내, 대외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요?



한국민속촌은 현대적인 체험활동과 SNS를 등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우선 SNS 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화유산을 단순히 박물관에 가서 보고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닌,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또한 구축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문화유산의 '보존'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닌,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최근 SNS 상에서 용인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과거 민속풍경을 재현해 놓은 것이 아닌 사약 마시기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과, '관상가', '춘향이' 등 개성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 문화유산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이 이러한 새로운 홍보방법을 이용하여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의 관심을 끈다면,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홍보효과가 클 것입니다.


경복궁의 수문장 교대식

경복궁의 수문장 교대식 등의 행사도 인기입니다. 이처럼 문화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젊은 층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사용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을 세계화하는 일의 기본은, 전 세계에 우리 문화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관광지의 안내판, 홍보 책자 등에서 번역 오류가 발견되고, 최근에는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국가문화유산포털이 오류 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빨리 시정하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우선적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정보의 제공 이후 이제 국가도 다양한 홍보방법을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홍보에 나서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우리의 자랑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하고 더욱 널리 홍보하여, 전 세계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③ 김승찬(동아대학교 경영학과)



한류의 대표격인 K-POP은 아시아에서 큰 히트를 친다.

21 세기 대한민국은 한류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와 k-pop 이 미국 헐리우드에서나 가능할 법 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한류 붐을 일으키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는 경쟁력이 없다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지배했었다.

하지만 한류 붐을 통해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큰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의 소용돌이 때문에 잃어버린 잠재력을 되찾았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5000 년 전부터 문화를 즐기는 민족이었고 문화유산을 만들어내는 DNA 가 우리의 몸에서 흐르고 있지만 일제시대, 한국전쟁, 군사정권을 거치며 그 잠재력이 봉인 당하게 된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문화산업에 서서히 투자하게 되었고 그 결실 중 하나가 한류가 된다.

한류를 통해 세계에 우리 문화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여주는데 성공하고 한류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한 만큼 그 한계도 빨리 찾아왔다. 기존 한류 콘텐츠에 사람들이 식상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류를 이끌었던 콘텐츠의 대부분은 서양에서 건너와 한국에서 한국화한 후 다시 판 것에 가깝다. 우리의 색을 입혔지만 그 색이 완전한 우리의 색이 아닌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문화콘텐츠 잠재력을 가졌다. 다르게 말하면 그동안 축적된 우리나라만의 문화유산이 존재하며 우리의 문화유산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류 선발대(드라마, K-POP, IT)가 세계 문화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새로운 한류는 무엇이 필요할 까?

이제 우리의 색이 많이 입혀진 한류 본진 부대를 투입하여 아시아 시장이 아닌 세계 시장에서 활약해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활약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



93차 월례토론회는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 논의 했다.

지난 3 월 26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제 93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문화유산의 세계화 방향과 고려해야 할 점 등을 논의하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유네스코 목록의 등재가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이렇다.

이상해 명예교수는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보호법 제정을 주장하였고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상미 교수**는 문화유산 ODA 산업과 국제적인 문화유산 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배일환 교수는 지속적인 홍보의 중요성과 북한과의 문화 교류(문화 단절 예방 차원)를 주장하였다. 신숙원 교수는 문화유산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세종학당의 확충으로 한국 문화 보급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전택수 교수**는 문화유산 문화산업 예술 미디어로 이루어진 창의산업을 만들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같이 좋은 내용들이지만 제일 중요한 말은 이 토론회의 끝에 나왔다, 그 말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해 잘 모른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자국민이 자국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창의산업과 유네스코를 운운하는가?'



두 문화 수출국은 그 문화를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

프랑스와 일본의 문화나 문화콘텐츠가 강한 경쟁력을 가진 이유는 그 경쟁력 뒤에 그 문화를 소비해주는 국내 소비주체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지지가 오랫동안 유지되었기에 자신들의 문화에 더 많이 투자하였고 더 많이 홍보하였기에 문화 콘텐츠 수출국이 되었다.

세상의 유명세를 탄 물건이나 사람을 보면 자부심이 없는 것이 없다. 지금 한류가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국민의 강력한 지지와 자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한 그 '무언가'다.


역사의 소용돌이는 우리 문화를 돌아 볼 시간마저 빼앗아 갔다.

우리 국민이 우리의 문화를 잘 몰랐던 이유는 역사적인 원인이 크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문화권에 전 국토를 유린당한 경험이 있고 우리의 문화는 그들에게 졌기 때문에 후진적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게다가 부족한 문화 인프라와 좋지 않은 시대 상황까지 겹쳐 우리의 문화에 대해 생각이라도 할 여유가 없었다.

다행히 민주화 이후 우리 전통문화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여유가 생겼고 꾸준히 재평가 및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잃어버린 역사가 큰 만큼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를 운운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다.

우리 것이 낡았다는 인식을 타파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세 가지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우리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리파인(REFINE)하는 작업 그리고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악소녀 송소희는 한국 전통문화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다.

현재 남아있는 전통문화는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로 인해 낡았다는 인식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다. 이 전통문화에 현대 디자인 기술과 한국의 첨단기술을 혼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전통문화 전통 문양을 제품에 삽입하거나, 첨단기술을 동원해 한옥주택의 가격을 낮추어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부 명성을 얻은 예술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영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무형문화재도 공연 초대와 소액의 자금지원이 전부고 기능보유자들도 타이틀만 있을 뿐 실익이 없다. 이들이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자금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국내나 국외에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여 혹시 모를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문 무형 콘텐츠의 수익창출을 위해 화 예술인에게 경영학 및 마케팅 능력을 겸비하게 하여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식을 갖추게 해야 한다.

전통문화가 대중에게 다가가려면 고급화 전략을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 고급화 전략이 일종의 장애물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각종 행사 및 길거리 공연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과 함께 즐겨야 한다.

정부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교육과정에 전통문화 체험과정을 넣는 것이다. 자라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몸으로 자주 접하게 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과 우리 문화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전통문화 산업 종사자를 선생님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다.

또한 공예품과 같은 전통 문화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신규 개발사업 시 전통 디자인을 많이 가미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초밥이 고양이 사료 취급을 받았다면 믿겠는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일본 초밥은 100 년 전엔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는가? 고양이 사료 취급을 받았다. 지금 일본 초밥의 위상을 생각하면 상상이 안가는 일이지만 사실이다. 일본 초밥은 초밥의 세계화를 위해 100 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이것은 일본 국민들의 꾸준한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화하려면 세기에 걸친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 국민들도 전통문화를 꾸준히 지지해야 하며 전통문화 스스로도 지지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자가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④ 김지용(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문화는 그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을 대표한다

문화는 특정 지역의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관습, 언어, 예술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인류 전체가 기꺼이 가꾸어 나가야하는 이유는 문화는 그 문화를 형성한 지역 사람들의 전통과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문화는 그 문화를 만들어간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특히나 문화의 대표적 소산인 '문화유산'은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이 그대로 담겨진 인류 공동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1972 년 유네스코에 의해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한국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한국의 고유한 정체성을 알릴 수 있다

K-pop, 드라마 등 대중문화의 한류를 통해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지만 이러한 대중문화는 트렌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며 한국만의 근원적인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제 93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문화유산의 세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의 발제를 맡은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세계유산목록 등재 자체가 결승점이 아닌 앞으로의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가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적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유네스코 목록 제도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국제화는 바람직하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우리문화유산이 선도화가 되어야 하며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일환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는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농악과 같이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은 그 가치가 뛰어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형문화유산들은 세계의 문화유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예술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의 농악이 2012 년 아리랑을 시작으로 17 번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은 세계화의 잠재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는 한국의 대외적인 국가이미지 상승과 한국만의 문화적 정체성, 대표적 이미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이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무형문화유산이 '걸작(masterpiece)'가 부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걸작이란 창조적 소산이면서 천재성을 내재하고 있는 예술적 작품을 말합니다.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걸작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대표하는 농악이나 판소리 등은 그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지만 그것을 대표하는 걸작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에는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화유산들은 작품의 유형이 아닌 걸작으로서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오페라의 경우에도 걸작으로 알려진 세계 3 대 오페라, 비제의 '카르멘' 푸치니의 '라 보엠'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로 오페라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문화유산 또한 걸작을 발굴하여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화를 위한 유네스코 등재 노력도 중요하지만 등재된 문화유산들을 더욱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노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들 중 하나로 '음악적 걸작'의 창작과 발굴이 있습니다. 걸작이라 불리는 오페라들은 '카르멘'의 '하바네라'와 같이 각각 대표하는 아리아가 존재합니다. 음악적 가치는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기 쉽기 때문에 오페라의 이름은 몰라도 오페라의 아리아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판소리의 경우에도 음악적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창'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음악적 가치가 뛰어난 걸작들을 발굴하거나 직접 창작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적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문화유산을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전문가, 예술인들에 대한 육성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국민들이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공연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문화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연문화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새롭게 창출되고, 걸작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화유산의 세계화는 해당 유산의 보호와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더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우리만의 걸작을 알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⑤ 김한준(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문화 선진국들은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1 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을 15 개 이상 보유한 국가가 21 개국이나 됩니다. 이 국가들 대부분은 미국,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스페인과 같은 선진국들입니다.

특히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10 개 국가들 중에 외국인 관광객 방문건수 10 위 이내에 들어가는 관광대국들이 8 개나 있습니다. 한류열풍으로 아시아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진정한 문화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3 월 26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이 마련한 제 93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우리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상해 성균관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담 부서를 마련해 지속적인 발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일환 이화여대 교수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고, 국가, 시민단체, 기관, 개인 등이 개별적 그리고 협력적으로 장, 단기 계획을 여러 차례 실시해야 한다고 했고, 박상미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문화유산 관련 ODA(공적원조예산)을 마련해 타국의 문화유산까지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등재시키고,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프랑스 외교관인 Jean-Christophe FLEURY 씨는 3 월 12 일자 매일경제신문 칼럼에서 많은 목조문화재들이 화재로 소실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도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보존에 관심이 없어 평범한 건축물이 자연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문화재의 보존과 관심에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 그리고 지역단체 내에서 문화유산 동아리를 많이 만들고 이들의 활동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지자체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동아리와 연계해 탐방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미국의 게임회사 ‘라이엇 게임즈’의 경우 2012 년부터 문화재청과 협약을 맺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국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지킴이'를 선정해 매월 전통문화체험 및 문화재탐방을 실시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난 3 월 28 일에는 한양도성을 걷고 성균관에서 유생들이 입는 유복을 입고 사적 제 143 호인 문묘와 성균관을 둘러보면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문화재 보호와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사회나 학교 내에서도 문화유산 동아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활성화되길 기다리는 것은 나무 밑에 누워서 열매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이나 지제체에서 이러한 동아리들을 발굴하고, '라이엇 게임즈'의 '문화재 지킴이'활동처럼 전통문화 체험, 문화재 견학 및 문화유산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동아리들이 문화재 발굴 및 보존현장에 참여하거나, 각 지역 소방본부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목조문화재 화재 대응 훈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보존이 국가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관심이 국가가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문화유산 동아리를 만들고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 준다면,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유산 세계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⑥ 박소정(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계는 각 국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노력 중 입니다.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문화의 소산입니다. 문화유산은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 현재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세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먼저 필요할까요? 이와 관련해 한국선진화포럼은 26 일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 93 차 월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화하면, 그 문화유산은 세계적 보편성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국가의 품격과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문화유산을 세계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즉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 널리 알려진다면, 우리의 대외적 이미지도 상승하면서, 국격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한국은 현재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력 끝에 농악이 세계문화유산과 인류무형문화에 만장일치로 등재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의 지적과 같이,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국의 문화유산을 하루빨리 세계화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한국 문화유산 세계화의 한 방안 입니다.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교수가 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의 등재는 문화 소유권의 문제나, 문화의 우열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지원까지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인 노력에 앞서, 우리는 대내적으로 국민이 우리 문화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농악이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에도 농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젊은이가 드물 정도로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세계화가 지속되며 다문화시대로 접어든 지금, 우리가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 한다면, 이는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문화 정체성 그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젊은이들이 문화유산을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용인의 한국민속촌이 즐거운 문화 관광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민속촌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았던 것처럼, 각각의 지역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어모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새로운 측면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배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점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 지 등 다각도의 측면에서 문화유산을 접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배일환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의 말과 같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 보다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박물관이나 유적지의 문화유산 설명을 살펴보면 대부분 딱딱한 줄 글인 경우가 많고, 한자어도 중간에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젊은 층이 한자를 잘 알지 못하며, 글보다 사진과 영상매체에 더 친숙함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제학 교수는 문화유산을 관광할 때 체험을 얻으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체험 관광에서는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제대로 알고 난 후, 우리의 문화를 알리려 애쓸 때 한국문화의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⑦ 박재형(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문화유산은 국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문화유산이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 · 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 정신적 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세계가 글로벌화 돼가며 비슷한 문화권에 속한 나라끼리 비슷한 문화유산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있으며 문화유산도 자국에서만 보존, 인정할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인정받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 93차 월례토론회가 열렸다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93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작업은 한국의 품격과 정체성을 보일 뿐 아니라, 그것이 인류 문화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이러한 작업은 문화유산을 생성한 국가의 품격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만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시급한 것은 문화유산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인터넷과 SNS, 즉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세계와 공유하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배일환 이화여대 관현악과 교수는 유형문화유산만이 아닌 무형문화유산에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유산의 세계화는 글로벌시대에 맞춰 우리나라가 시작해야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과 시작에는 기초가 있듯이 문화유산의 세계화에도 기초가 있어야 하며 그 기초는 바로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입니다.



숭례문 화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였다

2008 년에 있었던 숭례문 전소사건이나, 이번에 있었던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의 경우 소유자 집이 불에 타며 전소 또는 도난당했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제대로 보존을 못하면 문화유산의 세계화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훼손의 사례를 보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훼손을 하거나 발전을 명목으로 훼손을 하고 또는 문화재에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여 훼손한 자를 엄벌에 처해야 하며, 문화재 보호장치를 더욱더 자주 점검 및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 및 장치적으로 보존을 더욱더 강화하여 행함과 동시에 시민 및 아이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문화유산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의와 정신, 역사등을 교육시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하며 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유를 교육시킴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심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민속촌이라던지 지역의 문화유산 등을 견학하는 기회를 늘려야 하며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를 SNS 및 TV 광고 등을 통해 친숙하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게 잡혀있고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친숙하게 여기면 문화유산 훼손의 같은 경우는 줄어들 것이고 해외에서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통해 감탄을 자아낼 것입니다. 문화유산의 세계화는 국내로부터 내실이 단단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⑧ 박현진(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프랑스의 '에펠탑'

'프랑스'하면 에펠탑, '미국'하면 자유의 여신상, 우리가 한 번 쯤은 가보고 싶은 나라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제 93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유구한 문화유산들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불국사'

이에 대하여, 발제자인 이상해 성균관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유네스코 등재는 그 자체로서 글로벌 시대에 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문화유산 공적원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배일환 이화여대 관현악과 교수는 "유형문화유산만이 아닌 무형문화유산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음악 등의 무형문화유산을 강조했으며,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창의성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탁월한 보편가치'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숙원 서강대 영문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 문화유산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방법들 외에 대한민국의 문화유산를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석굴암'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만도 수 십여 개에 달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얼마 만큼이나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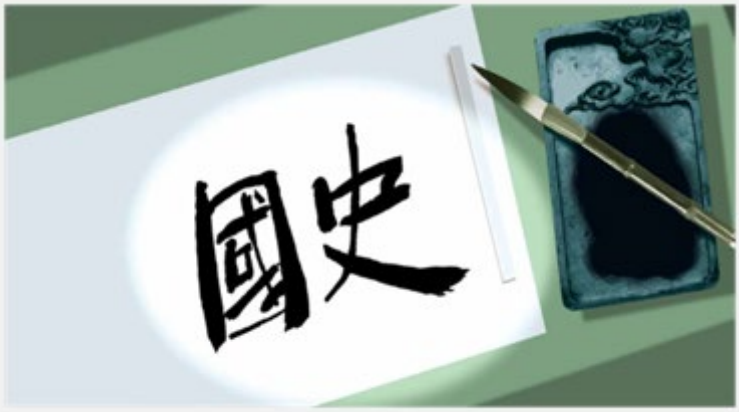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관련하여 깊이있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세계적 흐름 '한류'

특히, 한류문화의 전파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찾는 현 시대에서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외국인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세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교육의 중요성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미 많은 노력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고 줄기를 곧게 해준다면, 문화유산을 깊이 이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꽃을 피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커다란 흐름 속에 있는 한류가 이러하 문화유산의 꽃에 스며든다면,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세계를 향해 활짝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⑨ 백송희(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인 숭례문

여러분, 문화유산을 국가에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과연 어째서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문화유산이 우리 사회의 역사와 문화, 더 나아가 정체성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한류 문화가 국제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국인들의 자긍심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멋스러움을 넘어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사회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문화유산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허나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또 세계인들은 과연 무엇을 떠올릴까요? 어떤 사람들은 숭례문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K-pop 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문화유산이란 것이 딱히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추어 소중한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문화재 속에 담긴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93 차 월례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열린 월례토론회의 모습

발제자인 이상해 성균관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님께서는 문화유산의 세계화가 세계에 우리나라의 품격과 위상을 드높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유네스코의 등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업무 시행시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올바른 활용 및 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신숙원 사강대 명예교수는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은 문화유산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세계화 공유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료 목록 뿐 아니라 원문 자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사례로 중국을 제시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사이버 공간에 ctext.org 라는 이름으로 방대한 중국 고전을 올려 놓아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자료에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대내적인 접근성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조금 더 우리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SNS 를 활용하여 우리 고전 문화에 대해 홍보해야 합니다. 만약 방대한 문화유산을 접근성이 좋은 사이버 플랫폼에 올려 놓더라도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문화유산이 세계화를 이루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가치있는 문화 유산에 외국인들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경탄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화유산을 단순히 올려놓은 것 뿐 아니라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네티즌 사이에서 화재를 불러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컨텐츠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하여 세계에 우리 전통문화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재치 있는 twitter 활동으로 화제가 된 한국 민속촌

이에 대한 예시로는 한국 민속촌의 트위터를 들 수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 sns 활동에서 학술적일 뿐 아니라 재치까지 겸비하여 네티즌들의 입소문을 타 문화 유산을 알리는, 자칫하면 딱딱하게 느껴질법한 트위터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팔로우 하고싶어하는 트위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약 마시기', '민속촌 거지 등의 이색 알바' 등을 통하여 단순히 그 당시의 풍경을 재현해 놓을 뿐 아니라 국민 및 이 곳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모두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문화유산과 우리가 직접 소통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상당히 큰 성과를 내었으며 대내외적으로 문화 강국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 하고 싶다면 단순한 전통 문화유산으로써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재해석을 통해 문화 유산이 얼마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가까운 존재인지 깨닫고 발전시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제적인 사랑을 받으며 국민들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려야 하는 과제에 당면한 지금, 우리가 문화유산에 갖는 관심과 애정은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엔진이 되어 세계로 뻗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⑩ 송민상(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문화재를 통해 세계인과 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세계화시대 중요 과제이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는 한반도 전역에서 전통과 현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며 한국인으로서의 가치를 정립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해줘왔으며,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존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금까지와 같이 소중하게 보존하고 역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 계승시켜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일 것이며, 문화유산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발견·발굴하려는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화시대에는 이런 역할들에 더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세계인에게 가치를 공감시키고 인정받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 속에 담긴 고유한 민족정신을 세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음으로써 미래 인류문명에 우리 문화재의 정신을 전파해 나가고, 단순한 전통 문화유산으로서가 아닌 끊임없는 재해석을 통해 현재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가를 제시해줄 수 있는 지금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는 존재로서의 문화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93 차 월례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이상해 성균관대 건축학과 명예교수께서는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유네스코의 등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국내의 문화재 보호법의 기준과 UN 차원의 세계유산협약의 기준이 다름을 지적하시며,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한국의 품격과 정체성을 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의 한 부분으로 형성시켜 나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시키기 위해 중국의 '세계 유산처(世界遗产处)'와 같은 국가 차원의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님께서도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전담할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시다고 동조하시며. 중국의 공자학당과 같은 우리의 세종학당을 세계와 국내 곳곳에 더 많이 설립하여 한국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전파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해주셨습니다.



전담부처의 설치 등을 통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문화재의 세계화를 접근하자.

즉,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전인류적인 차원에서 공감 받을 수 있는 스토리를 담아내 정확한 언어로 전달하여 인정받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써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하면 에펠탑, 중국은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등등의 연상 사례들을 통해 문화재 그 자체가 종종 한 국가의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자리잡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며 국격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한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주고 있는 이미지는 '한국 전쟁'이나 '한강의 기적' 등으로써 대표적인 시각적 이미지가 부재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승격이나 대통령 직속 문화재의 세계화를 전담할 위원회나 기구를 창설 함으로써 한국인의 소중한 정신문화를 글로벌한 차원에서 공감 받을 수 스토리 텔링을 정확안 언어로 담아내는 노력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기구에는 문화재 전문가뿐만 아닌 국제기구 전문가 등을 전면적으로 배치하여 우리의 정신문화가 담겨있으면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재를 엄선하여 집중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류와 같은 대중문화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와 같이 문화재를 세계에 알릴 때 문화재를 단순한 관광 자원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문화까지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관점으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세계인의 지갑을 열기 위한 노력이 아닌 동감(動感)을 얻어 감동(感動)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⑪ 송소담(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꾸준히 사랑받는 '아리랑'

아직도 '아리랑'은 오직 한국인들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 '외국인이 부르는 아리랑', '외국인이 기획한 아리랑 공연' 등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리랑'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한류 문화가 국제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아리랑'도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문화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물질적 어려움을 정신문화적인 풍요로 보충해줌으로써 행복으로 부유한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행복한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93차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한국선진화포럼은 한국의 문화유산 확산과 공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문화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난 3 월 26 일 제 9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패널로는 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그리고 배일환 이화여대 관현악과 교수가 참여하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는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패널로 참여한 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문화유산 공적원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기하였고,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문화유산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세계와 공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창의성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탁월한 보편가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배일환 이화여대 관현악과 교수는 "유형문화유산만이 아닌 무형문화유산에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쏟아야 하고, 문화에 있어서 전통성과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은?

실제로 유형문화유산만이 아닌 무형문화유산에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쏟아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문화적 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이 외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민족의 얼과 사랑을 내포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계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민족의 얼과 사랑을 내포한 정신문화유산에 집중하면서도 '무형'이라는 특성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무형문화유산에 집중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가치계승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테면, 2014 년 북한 최초로 '북한의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입니다. 이는 '아리랑'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남북 간의 교류는 물론, 우리만의 아리랑이 아닌 세계의 아리랑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리매김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화의 전통성과 다양화를 강조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세계화시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여 이를 세계화 시킬 수 있을까요?



지적재산권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우선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은 모두가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인식되는데, 이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전승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지적재산권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놓고 과거에 중국이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으로부터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국가에서 중국의 '세계 유산처(世界遗产处)와 같이 국가 차원의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복한 선진사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정신문화적 풍요로 이를 보충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행복으로 부유한 선진사회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유구하고 위대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민족의 얼과 사랑을 내포한 정신문화유산에 기반하여,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과 기존의 유형문화유산을 존속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점 도시화, 세계화 속에 잊혀져 가는 우리 민족정신의 후대 계승과 한국적 가치를 인식시켜 세계 속으로 한국 문화유산을 확산시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⑫ 윤수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국가의 문화 유산은 그 나라의 국격과 정체성을 나타낸다.

한 나라의 국격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뛰어난 국력, 경제력과 같은 요소들은 한 나라를 '강한 나라'로는 보여줄 수 있지만 결코 '매력적인 나라'로 보이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뛰어난 문화유산인데요.

단순히 역사적인 유적지들만이 아닌, 지식재산권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한류 문화까지 다양한 한국의 세계문화 유산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지속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주요한 동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93차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이러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더욱 확산하고 공유함으로서 국가 브랜딩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3 월 26 일, '문화유산의 세계화'라는 주제와 함께 문화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 9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맡았으며,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와 발제를 한 가운데 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그리고 배일환 이화여대 관현악과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와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가장 먼저 주제 발표와 발제를 맡은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는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패널로 참여한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문화유산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세계와 공유하는 일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으며, "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문화유산 공적원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일환 이화여대 관현악과 교수는 "유형문화유산만이 아닌 무형문화유산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문화에 있어서도 전통성과 다양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으며,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창의성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탁월한 보편가치'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한국 문화유산의 관리는 곧 체계적인 국가 브랜딩의 관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무형문화유산과 같이 전통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강조할 수 있지만 관리가 까다로운 형태의 문화유산들은 세계화 시키기 어려울 뿐더러 가치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브랜딩이 필요하다.

우선, 뛰어난 유·무형 문화유산들은 디지털화를 통해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 문화유산의 뛰어난 면모가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전 세계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선진 국가 브랜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한국문화유산만이 가지는 고유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브랜드화 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화유산 관리를 전담하는 정부 부서를 설치하고 그런 관리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주관함으로써 선진 국가 브랜딩을 위한 한국 문화유산의 선진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에 대해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한국문화유산의 아룸다움과 전통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동반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 고유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적문화유산을 개발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나, 사물놀이와 재즈의 만남과 같은 독특한 콜라보 작업들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 쉽게, 그리고 파급력 높게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담 관리부서를 통해 다양한 전통문화 예술인들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그들이 문화유산 보존과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당장의 수익성 보다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선진국 다운 문화유산 육성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 세기의 선진화'란 단순히 높은 경제력과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인류 보편의 감성을 건드리고, 감화시킬 수 있는 힘이야말로 장차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지름길이 되어 줄 것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우리 고유의 민족 정신의 가치를 담은 한국문화유산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를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계화 시킴으로써, 우리 고유의 선진 국가 브랜드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⑬ 이윤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한류열풍과 더불어 전통문화유산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말로 된 노래가사를 따라하는 베트남 소녀,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어 공부를 했다는 홍콩 학생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류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데에 비하여 한국문화유산의 세계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들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한국선진화포럼 93차 월례토론회 : '문화유산의 세계화'

이와 관련하여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제 93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문화유산의 세계화 방향과 고려해야 할 점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해 성균관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세계유산목록 등재는 그 자체로서 글로벌 시대에 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이것은 곧 한 국가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이자 세계 속에 해당 국가를 제대로 드러내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과 교수는 문화유산 관련 공적 원조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문화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으며 신숙원 서강대 영문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 문화유산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지속성과 차별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통문화유산에는 문화의 세계화에 있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열쇠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는 문화유산을 통해 세계인들을 매료하고 공감시키며, 나아가 국가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세계인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을 제대로, 그리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관광가이드의 잘못된 역사설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경복궁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해설교육을 받지 않은 일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들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궁궐의 창살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엉터리 해설을 하는 등의 행태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빚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유산은 그 나라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는 만큼, 우리의 문화유산이 잘못 알려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통역해설사 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해설사들 역시 검증을 통해 채용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질 높은 해설사를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한국사 전공자 중 외국어가 가능한 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문화유산의 세계화 방안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감각적이고 유연한 것을 좋아하는 현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딱딱하고 박물관 안에 죽어있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친근하고 색다르게 다다갈 수 있는 신선한 접근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천공항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의 전통문화

다채로운 한국 문화가 잘 녹아있는 좋은 사례로 인천공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천공항은 문화예술공항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한옥, 정자, 디지털체험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한국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궁중문화, 전통미술·음악, 인쇄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센터, 전통공예전시관 등 여객 동선을 따라 공항 곳곳에 총 12 곳에 달하는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가행렬 퍼포먼스, 국악 실내악 연주, 전통공예 체험프로그램 등 여러 행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쉽고 다채롭게 보여주면서도 접근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단순히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외국인, 한국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관광명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문화유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지원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문화유산의 관리나 보존에 있어서는 노력해왔지만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학과라고 할 수 있는 역사문화콘텐츠학과가 있는

대학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문화유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세계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역사·문화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이 우리 것에 대해 인식하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와 역사를 설명해주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해설사들의 질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관련 학과 개설과 투자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취향에 맞게 개발해내는 것, 그것이 결국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⑭ 이정진(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문화 산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K-POP 과 한류를 떠올릴 것입니다. '싸이'를 통해 한국을 알고, '빅뱅'과 '슈퍼주니어'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현재, 문화 산업은 국가의 주요 산업이자 목표로 굳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은 곧 국가의 세계적 보편성을 증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앞으로에 대한 국가 전 가능성까지 점쳐볼 수 있는 주요 산업입니다. 그러나 문화 유산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문화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문화 유산의 전도와 발전을 위하여 지난 3 월 26 일 한국선진화포럼은 '문화유산의 세계화'라는 주제 하에 제 93 차 월례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이상해 명예교수는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첫 걸음은, 중국의 만리장성 혹은 프랑스의 에펠탑과 같이 특정 국가를 떠올리면 특정 이미지와 연결되는 대표적인 대표 유산을 육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국가들의 자국을 대표해는 문화 유산을 위한 경쟁며 심화되고 멌다.

한국에는 현재 경복궁, 수원 화성 등 세계 문화 유산에 지정된 문화 유산이 많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등록 문화 유산의 갯수가 각 나라의 경쟁 사항이 되는 만큼, 주변국들과 경쟁을 통해 세계 문화 유산을 늘리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한국'을 떠올렸을 때 경복궁 혹은 화성을 떠올릴까요? 한국에 오게 되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며, 만약 들리게 되었을 때 문화 유산 주변 또한 풍부한 구경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걸맞는 대표 문화 유산이 생각나도록 만들기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표 문화 유산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홍보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인 것일까요?

실제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문화 유산이 많은 역사의 도시 '경주'를 방문했을 때, 외국인 친구들은 문화재를 둘러본 후 차에 타 이동하여 다음 문화재를 구경하는 '겉핥기'식 여행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겉핥기 식의 관광보다는 한국을 뱔 수 멌는 스토리텔링식 관광며 필요해다.

한국에 걸맞는 대표 문화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 유산과 문화 유산 사이의 스토리 텔링이 필요합니다. 혼자 한국으로 여행을 와 문화 유산을 둘러보더라도 한국 문화 유산의 장엄함과 한국만의 특색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천마총, 안압지 등에 순서대로 스탬프를 배치하여 스탬프와 함께 설화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설화를 완성한 뒤에는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여 참여를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 스스로가 한국 문화 유산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최소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 유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국민들이 한국 문화 유산을 자랑스레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외국인들이 문화 유산을 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며, 한국의 세계 문화 유산이 진정한 '세계' 문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⑮ 정우재(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 93차 월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을 거치며 절대빈곤의 최빈국 수준에서 세계 10 위권의 경제국가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을 통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경험했을지라도 정신적인 즉,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정신적인 만족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야 중 하나가 문화입니다. K-pop 과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가 국제적인 사랑을 받으며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는 인류와 사회에 풍부한 정신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 9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는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은 한국의 품격과 정체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인류 문화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대내적 관리와 대외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배일환 이화여대 교수는 유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역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전통문화의 다양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중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문화유산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공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져 있으면 쉽게 익숙해질 수 있다.

21 세기에서 문화의 파급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양식에서부터 음악, 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도 매우 다양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등 하드웨어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문화, 국민성 등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문화의 힘을 인식하여 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내적인 관점에서 한국인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무관심 혹은 배척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원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조차 관심을 가질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높습니다. 교육열은 그렇게 자랑을 하는 반면 육백 개의 서원이 전통 교육유산임은 알지 못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문화유산 보기를 돌같이 보고 있으며 찾아가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전통문화유산에 대해 배척을 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양의 문화를 더 동경하고 익숙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커녕 낡고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유산에 '익숙해지기'가 필요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거의 접하는 일이 없다보니까 자연스레 낯설게 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곳곳에 전통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과 같이 도심 속에서 현대 문화와 옛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학생들의 문화 현장체험학습을 벤치마킹하여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문화 체험하는 날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대신 전통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과거 전통유산인 서원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것이 과거의 현재의 연결고리를 잇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한다면 우리 문화에 대한 막연한 배척과 무관심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유산에 익숙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무관심 혹은 배척은 무엇보다 재미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스토리가 담겨 있는 컨텐츠는 그 흥미가 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를 널리 전파해야 한다.

대외적인 관점에서는 '소통하기'가 필요합니다. 한류 열풍은 '겨울연가'같은 드라마와 K-pop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대장금은 이란에서 시청률 90%를 기록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이처럼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만큼이나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긴 글보다는 짧은 글, 글 보다는 그림, 그림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핵심을 간결하게 전하고 흥미를 끄는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아프리카와 같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한국 문화를 전파한다면 한국 문화의 세력을 넓힐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이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짐바브웨 대학교에 중국어학과를 설립하고 도서관에 중국 책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연스레 중국의 문화를 접하고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우호세력을 넓히는 동시에, 문화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문화 대국, 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강국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는 커녕 한국 문화의 힘은 점점 약해져서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제 만큼이나 문화가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익숙해지기'와 '소통하기'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전통문화유산에 대해 잘 알고 친숙해지고 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유산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⑯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부)



프랑스인들의 프랑스어 사랑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UN 공용어 중 하나인 프랑스어는 감미롭고 부드러운 억양으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언어 중 하나인데요. 프랑스어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남다른 사랑과 자부심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몇 해 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모국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프랑스인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가사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모습이 방송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인들이 한국어 노래가사를 그대로 따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화의 힘 때문 아닐까요?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문화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프랑스인의 마음까지 움직인 문화의 힘

2012 년을 기준으로 프랑스는 세계 3 위의 관광대국으로서 770 억 유로(한화 111 조원)를 관광산업을 통해 벌어 들였습니다. 이는 프랑스 GDP 의 7%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또한 관련 일자리가 200 만 개나 생겨 일자리 창출 효과도 두드러졌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마카오, 홍콩이 각각 4,5,9 위를 차지하였고 세 국가의 관광수입의 총합은 우리 돈으로 200 조가 넘습니다. 최근 3 년 간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300 조를 약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대국의 꿈은 문화유산의 보호부터

문화와 문화유산은 관광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 년 106 만 명의 요우커가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2014 년에는 613 만 명이 방문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요우커들의 씀씀이를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13 조원이나 된다고 하니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42%였고 일본을 방문한

요우커의 증가율은 83%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에 최초로 누적 관광수입이 일본에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라 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러한 추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까요?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문화유산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05 년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 화재 사건과 2008 년 숭례문 화재는 문화유산이 한 줌의 재로 바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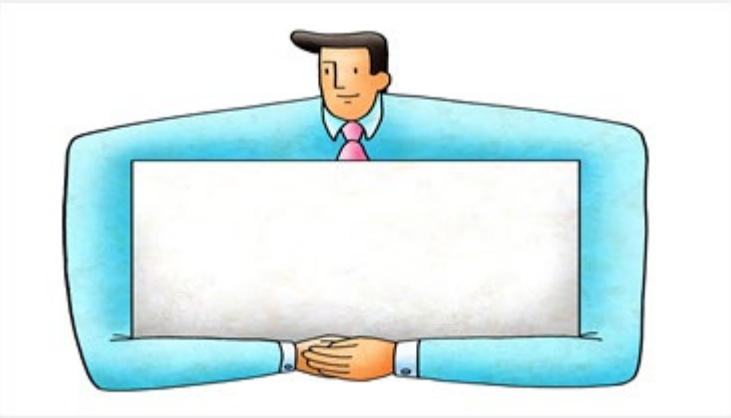
두 사건을 통해 문화유산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한 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먼저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 관련 제도와 법규를 정비해야 합니다.

국보 1 호였던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정기적으로 수원 화성, 경복궁 등의 문화유적지에서 소방훈련이 정례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문화유산과 문화유적지에 대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문화재의 보존은 문화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난의 위험은 각 문화재 관리 주체별로 사설 경비업체와 지역경찰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화재는 지역소방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도난, 화재, 보존의 문제 등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따라서 문화재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문화재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를 발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문화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 문화재청을 한 등급 격상시켜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부서를 나누고 부서마다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문화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만이 해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을 관광하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벤치마킹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문화유적지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1 시간 남짓 떨어진 하코네 국립공원은 화산 지대로써 온천이 유명합니다. 기념품을 파는 매장이 곳곳에 눈에 띄고 특산품인 흑계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 온천수를 이용해 생산하여 판매하는 흑계란은 온천의 유황성분 때문에 검은 빛을 띠게 됩니다.

한국어로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 이 계란을 하나 먹으면 수명이 5 년 늘어난다는 속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미 삼아 계란을 하나씩 사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창출을 위해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자.

일본사찰의 경우에는 전통 역술을 통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돈을 내고 제비뽑기를 하듯 점을 보는 방식입니다. 뽑는 종이마다 긍정적이고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글귀가 있습니다. 좋은 기분은 좋은

추억을 만들고 다시 한 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만듭니다.

중국의 경우 최근 공자아카데미를 앞세워 문화관광상품 전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자아카데미는 중국의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는 전초기지로써 이미 우리 나라 대학 및 교육기관에도 상당수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지역특산품과 연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요? 관광지마다 좌판이나 노점에서 지방 특산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체계화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농민과 연계하여 지역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역 특산품이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신화나 설화와 연결지어서 판매한다면 보다 판매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방 정부가 지역민들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하는 사업을 통해 특산품에 스토리텔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관광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고 농가소득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보다 많은 지원정책이 국가경제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산업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자.

정부는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벤처산업, 관광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우리가 가진 문화유산으로 세계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원재료입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제반된 노력들이 앞으로 관광대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⑰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삼은 단군왕검

저는 어렸을 때 만리장성, 자금성, 피라미드, 베르사유 궁전 등 세계의 문화유산들에 대해 배울때면 '왜 우리 나라는 저런 크고 웅장하며 멋진 문화유산이 없을까?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별볼일 없는 나라였나봐.'와 같은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쯤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며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사라진 것은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대로 배우면서부터였습니다.

우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건국 이념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의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은 기원전 2000 년에 나온 이념인데도 선타후아, 평등주의, 인도정신, 세계 인류에 최대 봉사한다는 세계적 대승주의 등 21 세기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지구촌 70 억 인류가 갖춰야할 사회적 덕목들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만들어낸 문자입니다. 애타주의, 애민정신이 담겨있는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 한글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훈민정음

위에 예시로 든 정신 문화유산들을 가진 국가들에서 '크고 웅장한 문화유산'을 위해 백성들이 혹사당하고 착취당할 때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지를 고민했으며 '크고 웅장한 문화유산'이 없음에 대해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크고 웅장한 문화유산'은 없지만 아름다고 우아한 창경궁,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인 직지심체요절 등 뛰어난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

SNS, 언론은 물론 주변에서 우리 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자기 비하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화유산을 평가절하하면서 남들은 좋게 평가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될까요?

우선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뽀로로, 라바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캐릭터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더 친근감있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생긴 이러한 호감은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애니메이션들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뽀로로와 같은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음 방안은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사 수업과 체험활동을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사 수업에서 책으로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딱딱합니다. 지금은 수학여행 때나 우리 문화유산을 눈으로 직접보고 느낄 수 있는데 최소 분기마다 이러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책으로 배우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학습효과를 줄 뿐더러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관심과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과 마주한다면 우리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도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졸업요건에 한국사능력검정 취득을 넣는 것입니다. 반발이 엄청날 것임은 당연하지만 졸업요건에 한국사능력검정 취득을 넣는다면 강제로라도 우리 역사를 공부하게 되어 모든 대학생들이 언제든지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민간문화 홍보대사로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우리부터 잘 알고 소중히 여겨야 세계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방안들로 사람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제대로된 이해, 관심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세계에서 알아주는 문화대국,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도 우뚝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⑱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8세기 무렵 조각된 석굴암은 극동지역 예술의 최고 걸작으로 인정받는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세계적 차원에서 향유되고 그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린왕자를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글로벌 경제성장에 뒤지지 않는 글로벌 문화유산의 실현은 결코 당위 명제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적 발자취가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단순히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적 자산이 에펠 타워나 만리장성에 뒤지지 않으며, 향유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부터 받아들인다면 외국인들의 관심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들의 변화와 실천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향 설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확산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실히 하는 일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체험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의 도시경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제고를 위한 고민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공간은 현대의 주요 활동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집 밖의 풍경을 떠올리면 지저분하고 복잡한 간판과 건물, 알 수 없는 영어가 새겨진 옷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일상 자체가

온통 우리의 것과는 관계없이 서구적인 것만 맹목적으로 추종한 결과로서 이도저도 아닌 잡다한 것들로 도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질적인 환경이 이렇게 잡탕이면 인격적 주체인 사람의 의식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모든 풍경을 남산한옥마을처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전통적인 경관을 세련되게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본받아 우리만의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위대한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국사학계의 교수님들 혹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문가 분들이 초•중•고•대학생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인 특강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가치를 전달한다면, 국가의 긍정적인 미래가 담보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학여행 또는 수련회를 무턱대고 해외로만 떠날 게 아니라,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국내로 발길을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유산들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과 유적지 답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실질적인 보상과 격려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데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경우, 문화재 복원전문가와 문화행정가를 양성하는 '프랑스 국립 문화재 관리 전문학교'에서 문화행정가와 문화재 복원전문가를 집중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박물관, 문서보관소 등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교육과정과 졸업 후 진로까지를 모두 국가가 책임지게 됩니다. 전국 곳곳에 유서깊은 문화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으로 사장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 국가의 문화유산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계승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관리자의 전문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 확산시키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면, 보존 및 관리 뿐 아니라 문화재에 스토리를 입히는 일과 같은 창의적인

작업들이 활성화되어 세계인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불의의 화재로 훼손되어버린 낙산사와 숭례문의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문화재에 익숙해짐과 더불어 이를 가꾸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동반하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아져서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사진 1:
http://www.cha.go.kr/unescoGallery/selectUnescoGalleryView.do?id=189962&hcode=record3&category=&searchWrd=
사진 2: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nomad80&folder=23&list_id=11153290

⑲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농악'

여러분들은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필자는 최근 수업시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농악'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 농민들의 삶을 반영한 자랑스러운 한국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농악에 대해서 많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농악에 대해 잘 모르는 필자와 같은 학우들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대게 신문에서 다양한 국제기사들을 보는 국제감각이 뛰어난 학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적인 것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세계화를 반기는 모습에서 문득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자신의 것을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것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통해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위대한 한국문화유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필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관심이 가지 않겠죠.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국문화유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교육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유산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은 '국사'로 한정되어 있지만 기계적인 암기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다보니 문화재나 유적지 등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것들만 외우고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문화유산을 체험하게 된다면 한국적인 것의 아름다움과 조상들의 천재적인 작품들을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교과서에서 보았던 사진 한 장의 경복궁을 실제로 본다면 그 웅장함과 섬세함에 매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문화유산을 답사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의 국사교육 커리큘럼 속에서 유적지 답사나 전통문화관람 등을 수업시간에 시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대해 깊은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유산, 세대를 초월하여 빛날 수 있도록!

다음으로는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그 중에서도 현대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오히려 현대에 와서 가치가 부각되는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적으로 수용된 문화유산은 현대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악을 예로 들어보자면 농악복장의 화려한 삼색이나 상모 등을 야광으로 만들어 어두운 실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농악대의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한 농악의 신명나는 리듬은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정겨운 소리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며 하나의 노래를 완성하는 모습은 현대에 필요한 '공동체의식'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문화유산의 현대적 의의를 잘 살피고 이를 돋보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세계에 알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부터 관심을 갖고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현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자신을 알고 타인을 알면 항상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문화의 범람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한국적인 것을 먼저 확립하고 외국의 문화를 접한다면 분명 한국이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출처〉
그림 1) https://www.youtube.com/watch?v=rGGSkc7D_4M
그림 3) https://www.youtube.com/watch?v=xMRcc21ow5c

⑳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우리의 문화유산은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 빛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한류가 국제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류가 다소 K-POP 과 드라마에만 치우쳐 있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기엔 한계가 있지요.

한 나라를 온전히 느끼기 위해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음식, 문화유산 등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고 느껴야 할 텐데요. 그러기에 우리나라가 가진 무궁무진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확산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업이자 행복한 인류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대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알고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화유산과 동시에 '내 주변'의 문화유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릴 적 수학여행지로 대개 천년고도의 경주를 꼽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장의 유적지는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저도 생각해보니 막상 주변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는 조선시대 왕들의 능이 모셔져 있는 서오릉이 있답니다. 또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산성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네 고장에 분포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먼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문화유산을 어린 학생들부터 학교에서 체험하고 제대로 알게하는 활동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발굴 외에도 이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과가 필요!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과 전문가 양성이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문화유산 관련 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교는 채 10 곳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과를 살펴보면 단순히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전문화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률적인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방법론과 실재를 중심으로 한 교과를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연구, 발굴, 보존만 하는 전문가와 이를 알리기 위한 PR 전략가의 역할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미래의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죠. 동북공정과 독도 문제의 경우에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호응을 일으킬만한 전문가의 노력이 있었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책과 캠페인이 전개됐을지 모릅니다.



최근 유투브 스타 '영국남자 조쉬'가 참여한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초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서비스를 해주는 자원봉사자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 외에도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영상이나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홍보한다면 분명히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류 3.0 시대를 만들어 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것을 잘 알고 이를 제대로 알릴 방법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진화된 시민의식으로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겠죠.

더불어 우리의 것을 지키는 전문가 교육과 양성과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전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문화융성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MRcc21ow5c
https://www.youtube.com/watch?v=yfODa2FmVFo
https://www.youtube.com/watch?v=WBb7R0LMsqA
https://www.youtube.com/watch?v=rMPE6BGxyns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서울대학교 제 2차 선진화연구모임이 개최되었다.

김수빈(서울대 언론정보 2):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제 2 차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연구모임에 참가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관한 제 93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문화유산 또한 우리나라에게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어 갈수록 그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외국인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문화유산의 홍보방안을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인환(서울대 언론정보 2): 홍보를 위해서는 우선 SNS 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페이스북에 '가고 싶은 여행지'가 뜨면 사람들이 태그를 달고는 하잖아요. 이러한 방안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SNS 는 한국인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조금 지엽적인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는 외국의 게시물들도 자주 보잖아요. 이처럼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은(서울대 경제 2): 한국관광공사 같은 기관들은 현재 SNS 를 하지 않나요?

김수빈(서울대 언론정보 2): 현재 다양하게 SNS 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어로만 작성되어 있고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외국인이 조금 더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관광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뜰에(서울대 정치외교 2): SNS 를 이용할 경우 꼭 국가기관만이 아닌 개인들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개인들이 재미있는 SNS 를 만든다면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복궁의 수문장 교대식이나 복식체험 등은 외국인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요,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배인환(서울대 언론정보 2):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효과적인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남산에서 한복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옷을 입고 제대로 사진 찍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짧았습니다. 또한 사전 예약도 필요해 과연 외국인들이 이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내. 외국인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지은(서울대 경제 2):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입니다. 작년에 체험해본 적이 있었는데, 다양한 외국어로 된 팜플렛과 안내판이 많아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 시티투어버스를 탔을 때는 일하시는 직원이 외국어를 잘 못하셔서 관광객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언어의 장벽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뜰에(서울대 정치외교 2): 시티투어버스 등의 경우, 체계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시티투어버스와 서울시티투어버스가 따로 존재하는데 배차시간도 전혀 다르고 다른 곳에서 예약해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수빈(서울대 언론정보 2): 네,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세계화, 즉 외국인에 대한 홍보 방안을 생각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복궁과 같은 유명한 관광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런 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 또한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동 쌈지길의 풍경

배인환(서울대 언론정보 2): 인사동이나 삼청동에 관광객들이 쇼핑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 지켜야 할 만한 가게의 건물들을 지원해주면 전통문화의 자취를 더욱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유형 문화유산 근처를 잘 정돈하고, 주위에 획일적인 상점들만이 아닌 더욱 한국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은(서울대 경제 2): 저희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께서 '신라금관 모양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며 이를 벽지 무늬 등 패턴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상품가치도 있으면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디자이너의 한글디자인도 이러한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가 에펠탑을 통해 로맨틱한 이미지를 만들었듯이 우리 문화유산을 응용한 상품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빈(서울대 언론정보 2):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문화유산의 홍보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았는데요, 우선 젊은 층을 위한 SNS 홍보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복체험이나 수문장 교대식과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과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홍보 확대를 위해 문화재 번역 오류 등을 시정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응용한 상품의 개발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바로 알기와 관련해 서울대에서 선진화 연구모임이 열렸습니다.

박소정(서울대 사회복지 3) :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농악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음에도, 이는 잘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등재된 사실 뿐 아니라, 농악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젊은 층의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우리가 먼저 보전하고, 제대로 알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문화유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어떻게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주제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려합니다.

먼저 저는 문화유산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문화유산을 사진과 함께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다라는 식의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응백 (서울대 경제 3) : 그러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더 많은 주입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입식 교육은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선향 (서울대 중문 4) :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오히려 저는 교육시간에서 역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조금 잘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지훈 (서울대 중문 5) : 저는 그것보다 관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은 여기를 '들렸다.'가 포인트로 같은 시간 안에 한 도시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보자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설명도 이 문화유산은 몇 년도 어느 왕 시기 누가 만들었다. 하고 끝이니 우리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해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관광을 지속하다 보니, 사람들이 눈 앞에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고도 아무 느낌 없이 앞에서 사진 찍고 넘기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선향 (서울대 중문 4) :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깊숙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저희 고향에 있는 관광 문화유산을 조사해, 스토리텔링식 설명을 붙인 후 영어로 책자를 만들어 교육청에 전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문화유산에 대해 기억도 잘나고 인상도 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엮어서 소개해준다면 이해를 더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 (서울대 중문 5) : 아는 선배가 일본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조그만 것 하나에도 자잘한 전설이 있어서 재미있었고, 의미없어 보이는 것도 전설을 듣고나니 뭔가 의미 있는 것이구나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설을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있는 전설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박소정 (서울대 사회복지 3) : 저는 한국문화를 대표하고,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점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유산은 많지만, 사실 제 고향에서 친구들이 와서 서울 관광가려면 어디로 가야하냐고 물어볼 때 어디를 말해야 할지 고민이 항상 들었는데, 우리도 프랑스 에펠탑처럼 우리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만한 랜드마크가 생긴다면, 보다 이해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응백 (서울대 경제 3) : 저는 랜드마크가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프랑스는 예전부터 절대적으로 문화가 풍부했으며, 지금도 파리하면 에펠탑이 아닌 다른 것을 떠올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텐데 굳이 랜드마크가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향 (서울대 중문 4) : 드라마와 역사적 내용을 엮는 것은 어떨까요? 사극 같은 곳에 등재된 문화유산을 알려준다면 더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박소정 (서울대 사회복지 3) : 그런데 사극의 경우는 자칫하면 역사 왜곡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선향 (서울대 중문 4) : 그래도 일단 그 문화유산에 대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약간 내용을 바꾼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 되지 않을까요?

박지훈 (서울대 중문 5) : 예전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서 실제로 어느 장면이 허구인지 알려주는 기법을 사용했었는데 그것을 응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향 (서울대 중문 4) :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과 허구가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알게하기 위해서 웹툰의 형식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젊은 층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웹툰을 더 많이 보고, 재미있기도 하니까.



드라마나 웹툰도 문화유산 바로 알기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지훈 (서울대 중문 5) : 조선왕조실록이 원래 대화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웹툰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박소정 (서울대 사회복지 3) : 저는 관광 가이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학원에 전화해 보니, 정말 따기 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이 있어도 재교육 시스템도 그리 잘 정립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응백 (서울대 경제 3) : 아 저도 재미있게 설명하겠다고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실질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을 사실인양 말하는 가이드를 봤습니다. 가이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서울대 중문 5) : 그런데 요즘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고, 가이드가 부족해져, 실제로 검증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소정 (서울대 사회복지 3) :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박 겉핥기 식이 아닌,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식 관광 프로그램이 등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광 가이드 검증, 드라마나 웹툰이라는 컨텐츠를 활용한 교육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우선 귀한 시간을 내어 고려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가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은 '문화유산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며 그 중에서도 무형문화재, 각종 공연형식의 문화재를 어떻게 세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해볼 것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다르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곳에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공연문화재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의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세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유홍권(고려대 식자경 1):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 무형유산을 알릴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해외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공자학원'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중국은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공자의 뛰어난 철학을 이미지 삼아 해외 여러 곳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을 통해 중국은 이미지 제고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또한 한국 고유의 성리학, 실학 등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들을 바탕으로 한 학원을 설립하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황과 이이를 비롯한 조선시대 성리학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들을 바탕으로 한 학원들이 설립된다면 중국의 공자학원 못지않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설립을 통한 한국 문화 알리기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문화 알리기는 참 좋은 방안인 듯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또한 공자학원을 모티브 삼아 '세종학당'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파는 무형문화재 발굴에 앞서 필수적인 작업일 것입니다.

오지원(고려대 식자경 1): 저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주제로 한 공모전들이 많이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이 수요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 문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모전 개최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무형문화재의 공급 수단을 늘리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무형문화재 세계화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모전이 많아진다면 우리 문화유산을 소재로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들도 많이 생겨날 것이므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 공연장 설립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박소현(고려대 식자경 1): 공모전 이외에도 전용 극장들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탈춤을 비롯한 우리문화의 특성상 전문적인 무대장치나 공연장이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관객들이 우리 문화를 쉽게 즐기게 하기 위해 전용 극장 설립은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 공연장 설립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흥미로운 방안들입니다. 무형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해 공급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방안들이라는 의견에 대해 공감합니다. 여기에 저는 좀 더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형문화재 중 가장 세계화, 보편화가 잘 된 케이스는 바로 '오페라'라고 생각합니다. 오페라는 세계 여러 곳에서 상시 공연되고 있고 유명한 아리아는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문화유산도 이러한 오페라와 같이 세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해야 합니다.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겠습니다만, 오페라와 같이 극문화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고 현재까지도 공연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는 '판소리'가 세계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현(고려대 식자경 1): 판소리는 그런데 오페라와는 다르게 세계인들이 즐길만한 준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언어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판소리는 언어유희를 통해 재미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번역하여 외국인들에게 공연한다면 판소리의 진정한 흥미를 많이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판소리는 그 시대에 대한 비판정신을 담고 있는데 이를 지금 그대로 공연한다면 판소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모두 전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판소리 세계화를 위해서는 대중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고 현대의 시대상에 맞게 재창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고급화시키는 로얄마케팅도 한 방안이다

아니면 오페라와 같이 판소리를 대중화가 아닌 고급문화화 시키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일종의 로얄마케팅으로 판소리를 교양 있는, 고급스러운 문화로 소개한다면 이 또한 외국인들의 수요를 늘리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로얄마케팅은 참신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소리도 오페라의 라 보엠, 카르멘과 같이 걸작(masterpiece)을 발굴하고 홍보한다면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김동현(고려대 식자경 1): 판소리는 언어적 장벽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역동적이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무형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판소리는 한국인들마저도 즐기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난타와 같이 관람하기 부담이 없는 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유산 중에는 난타와 같이 타악기를 소재로 한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물놀이나 농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공연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지원(고려대 식자경 1): 그래서 판소리와 같은 문화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문화 유산들의 현지화와 번역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악기를 이용한 공연들도 좋지만 우리 고유의 정서를 전달하는 데에는 언어가 필수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가 바탕이 되는 문화유산들을 현지화 시키고 번역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에 언급하였던 오페라 또한 다른 나라에서 공연될 때에는 원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현지 언어로 재창작되어 공연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판소리 공연도 오페라와 같이 꼭 한국인이 공연할 필요 없이 외국인들도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수용하는 입장에서 직접 공연하고, 창작하는 입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판소리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오페라와 같이 성공적인 세계화된 문화로 대표될 것입니다.

박소현(고려대 식자경 1): 이러한 세계화 방안들에 앞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접촉기회의 증가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국에도 지속적으로 전시회 및 공연들을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문화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해 간접적으로 접촉할 기회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 우리나라만의 대표적인 상징물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접촉기회의 증가를 줄 수 있는 수단은 많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

유홍권(고려대 식자경 1): 저는 앞서 말했던 외국인들도 우리 문화유산을 가지고 공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정립해야 합니다.

오페라가 다른 나라 현지인들로도 공연될 수 있는 이유는 오페라가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고 전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판소리 등의 문화유산들도 학문적 적립을 이룰 필요가 있고 체계적인 전문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무형유산, 공연문화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았습니다. 전용 공연장 및 전시회 등을 통한 공연의 공급수단 확보, 대중문화 등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접촉기회 증대, 우리 문화유산의 현지화와 로열 마케팅, 한국 무형문화유산의 학문적 체계 설립과 같이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우리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화에 힘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한국에는 뛰어난 문화유산들이 많이 존재한다.

윤수정(연세대 정치외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선진화 연구모임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세계 유수의 문화유산에 비견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뛰어난 역사적 명승지와 문화유물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강남스타일을 비롯한 한류 열풍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지금에야 말로 그런 뛰어난 한국의 문화유산을 잘 알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뛰어난 문화유산을 세계인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성공적인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고유 브랜드 가치 창출'이라는 소주제 아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분들께서는 구체적인 의견들을 부담없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정(서강대 국제한국학): 저는 우선 문화유산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 브랜드 마케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유산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 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저는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적문화유산을 개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한류를 적극 이용하거나 사물놀이와 재즈의 만남과 같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 쉽게, 그리고 파급력 높게 알릴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양문철(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 저 역시 공감합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창경궁의 비원의 경우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제한 관람이 허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뛰어난 문화관광명소입니다.

이런 명소에 대한 정보를 관련 다큐, 음악, 사진전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법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노출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우(명지대 생명과학정보학): 저는 앞서 위수정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문화유산을 보다 잘 관리감독하고 보존할 수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훼손되기 쉬운 문화유산들의 경우 전격적인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교육으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바로 알고 그 가치를 계승해야 한다.

김주영(명지대 국어국문학): 저는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교육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잔존해 오래도록 기억되고 기려져야만 문화유산이 그 가치의 의미를 제대로 지니는 만큼 후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올바른 역사문화 교육을 잘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형문화재와 같이 형태 보존만으로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승시키기 어려운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그것이 문화의 한 뿌리로 자리 잡아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홍보나 시연과 관련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신지연(이화여대 의류학): 저 역시 교육이 문화유산 보존에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는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문화유산의 세계화의 성공 여부는 결국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매력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이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 자신의 문화유산에 대해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문화 교육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SNS 채널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박수미(이화여대 문헌정보학): 저는 온라인 채널 및 SNS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한국민속촌의 경우 '속촌아씨'라는 캐릭터를 통해 사극 페스티벌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캐릭터화 해서 적극적으로 SNS 채널을 활용한다면 보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잘 알릴 수 있을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정(연세대 정치외교학):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문화유산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세계화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정부 전담부서를 만들고, 올바른 역사문화교육을 통해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승하는 동시에 다양한 매체나 콜라보 형식, 그리고 SNS 홍보 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 브랜드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데에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주신 모든 의견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선진 문화유산 국가로써의 대한민국의 면모를 지켜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세계문화유산의 올바른 운영 방안'를 주제로 제 2차 연구모임을 진행하였다.

이정진 (국제관계 3) :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국내 문화유산의 육성방안을 논하기 위해 지난 3 월 26 일 한국선진화포럼은 '문화유산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로 소주제를 잡았으니,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에 걸맞는 대표 문화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 유산과 문화 유산 사이의 스토리 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천마총, 안압지 등에 순서대로 스탬프를 배치하여 스탬프와 함께 설화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설화를 완성한 뒤에는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여 참여를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문화 유산을 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각 나라 관광객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가이드 운영이 필요하다

김시훤 (국제관계 3) : 먼저 관광가이드의 전문적 육성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관광객들은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고용한 여행사의 여행가이드를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의 해설에는 오류와 한국비하, 역사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 관광객이 한국 문화 유산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언어능력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통합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지석 (국제관계 3) :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문화 산업 육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해외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히 우리나라에 관광을 많이 오는 것은 일본인이나 중국인인데 반해 가이드는 영어 전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각 세계문화유산마다 관광객들에게 알맞는 언어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가이드를 양성해야 합니다.

황주영 (국제관계 3) : 저는 이정진 학우의 의견에 덧붙여서 말하자면, 관광에 동기를 부여했으면 합니다.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경주의 경우 스탬프 찍기 행사를 통해 흩어진 문화유산을 찾아가는데에 동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스토리 텔링 식의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을 높여 문화 특구를 개발해야 한다

이황제 (국제관계 3) : 저는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높여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한 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까지 홍보하는 효과와 함께 보다 다양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세원 (국제관계 2) : 저도 이황제 학우의 의견과 유사합니다. 문화 유산 주변 지역에 대하여 관광도시화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러운 확대 접근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기업에 세계문화유산 코스를 지정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어드벤티지 부여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훤 (국제관계 3) : 추가적으로 저는 입장료, 관람료 등 이용요금을 높이는 정부의 운영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은 공짜다"라는 국민들의 인식은 문화 유산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입장료와 관람료 등이 바로 그 유적지, 문화재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유산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그 가치에 알맞게 가격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정부와 시자체가 함께 문화유산 내 정기적인 소규모의 문화행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기성 혹은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 행사가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정기적인 행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문화가 있는 수요일'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진 (국제관계 3) :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논의한 바처럼 소중한 정책 제안들이 한국의 문화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④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다혜 : 우선 중간고사 기간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한류 문화가 국제적인 사랑을 받으며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향상시켜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낯설게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관심이 없는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하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세요.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

이지효 (이대 경제): 대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대학생 서포터즈 같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자나요? **문화재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보존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활동을 하면 어떤가요?

또한 각 지역의 대학교마다 **관광안내 동아리를** 만들어 주말에 유적지 같은 데서 관광안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관광 안내와 같은 서비스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강지은 (이대 보건): 유럽 사람들의 경우에는 문화유적, 박물관 등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흥미 있게 참관 하는데 우리에게는 '문화유산' 하면 약간 지루하다는 느낌? 이런 고정 관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문화유산의 스토리 텔링"**을 중점으로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경복궁 야간 개장'처럼 인기 많은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진행하고 거기에 대학생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면 관광객도 좋고 학생들도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문화재 등재 사업에 대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김소현 (이대 소비자): 역사나 고고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등재하는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볼 방안입니다. 특히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문화유산 세계화의 사업에 참여한다면 자신감도 생기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김다혜 (이대 중어): 좋은 대안들입니다. 특히 지난번 NGL 들과 경복궁 참관을 했는데, 안내 표지판 같은 작은 부분들이 부족함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인 우리도 불편한데 외국인들은 더 하겠죠. 이런 부분을 대학생들이 맡아서 참여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 중, 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특히 대학생들의 **동아리 MT 나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들을 문화유적지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치 좋은 야외에서 역사와 문화유적을 둘러보면서 자긍심도 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지효 (이대 경제): 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저는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드라마 제작이나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극 드라마 <대장금>이 유명세를 타면서 세계에 한류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이 많이 노출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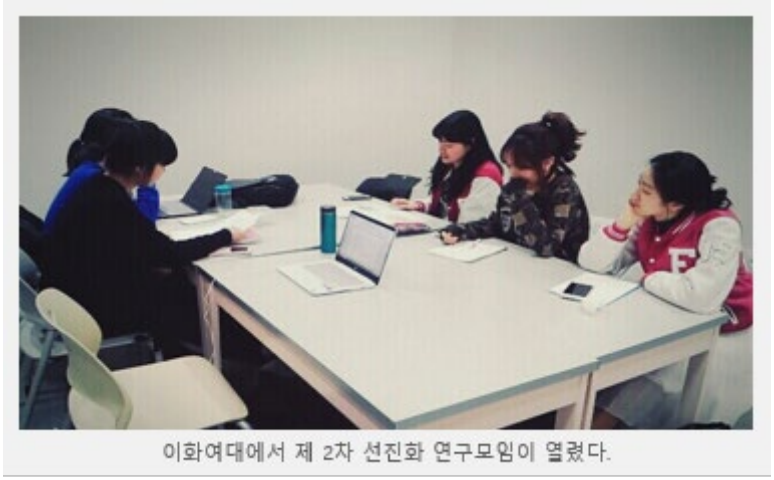
SNS를 등한 다양한 이벤트 진행

강지은 (이대 보건): SNS 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지금 대학생들입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SNS 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문화유적, 유산을 사진 찍어 올리는 이벤트**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면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현 (이대 소비자): 저는 문화유산의 발굴 과정부터, 문화유산의 세계문화재 등재, 보존, 관리에 대한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방영한 1 박 2 일 같은 경우 문화유적을 찾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대가 시청하기 때문에 교양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다혜 (이대 중어중문): 저도 "꽃보다 할배"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리스 유적을 돌아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학습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유적들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대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서포터즈 활동**, **관광안내 동아리 활동**, **수학여행이나 워크숍을 문화유적지에서 진행**하는 것, 대학생들의 문화재 등재 **인턴 기회**,**SNS 그룹 이벤트 활동**, **예체능과 드라마를 통한 콘텐츠 제작** 등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이화여대에서 제 2차 선진화 연구모임이 열렸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우리의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세계인의 공감을 통한 문화유산의 세계화 방안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감각적이고 유연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 딱딱하고 박물관 안에서만 접할 수 있는 문화유산보다는 어디서든지 친근하고 색다르게 다다갈 수 있는 신선한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인천공항이 있는데요, 공항이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는 곳이라고 떠올리기 쉽지만 인천공항 내에는 한옥, 정자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한국문화거리, 궁중문화, 인쇄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센터 등 공항 곳곳에 12 곳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전시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가행렬 퍼포먼스, 국악 실내악 연주, 전통공예 체험프로그램 등 여러 행사들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통문화를 쉽고 다채롭게 보여주면서도 공항이라는 특성상 접근성 또한 높기 때문에,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예인 것 같습니다.

심수영(이화여대 교육 2): 그런 곳이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우리 문화를 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공항에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혜(이화여대 교육 2): 대신 콘텐츠를 만들 때는 진정성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문화를 경험하는 관광객이 느끼기에 너무 인위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문화체험을 하도록 하되 너무 작위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심수영(이화여대 교육 2):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만나면 “Do you know KIMCHI?”라고 묻는 등 너무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것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수빈(이화여대 교육 1): 저도 콘텐츠 개발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와 더불어 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민속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사약 마시기 체험. 춘향이 분장 등 방문객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처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유진(이화여대 교육 1): 저도 윤진 학우가 말한 인천공항이 참신한 사례라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그 공간을 벗어나면 그 전통문화를 느낄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경복궁에 가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지만 조금만 나오면 바로 그 느낌이 끊기고 맙니다.



전통문화와 삶이 연결될 수 있는 코스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생활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광객이 다닐 수 있는 코스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제 생각에는 홍보할 때에 있어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파리하면 에펠탑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처럼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글을 시각화시켜서 이미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세계에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글자를 조합해서 그림 등을 만들어 홍보하거나 한글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지은(이화여대 교육 1): 이상봉 디자이너가 한복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새겨서 쇼를 여는 등 시각화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연아가 아이스쇼에 입고 나왔던 수묵화 같은 것도 한국적 이미지를 잘 시각화했다고 봅니다.


스토리식 설명을 위해 문화유산과 관련한 설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은혜(이화여대 교육 2): 문화유산과 관련한 스토리 개발은 어떨까요? 관광 유적지만 보면 큰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 문화유산에 얽힌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전해져오는 재미있는 전설을 좀 더 알기 쉽게 써놓는 등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스토리 해설을 잘 할 수 있는 해설사들의 질 보장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투자와 검증을 통해 해설사들의 질 보장을 해야 합니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저도 그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가보면 제목이 한자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많고 설명 또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 학우가 말한 것처럼 관련한 설화 등을 적어놓는다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사와 관련한 주장에 있어서도 적극 동의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한글은 창살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등 잘못된 역사상식을 퍼트리는 일부 관광통역안내사들이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못 알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가 권위와도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해설사들의 질 보장을 위한 제도가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은(이화여대 교육 1): 대학교와 연계해서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에 많은 중국인이 관광 와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차라리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이나 날짜를 지정해서 그 때를 이용해서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한다면 학교도 좋고 국가적인 문화홍보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요?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발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활용하는 것도 국민들과 외국인의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뮤지컬 등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하자.

전에 궁궐을 배경으로 '궁'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스토리에 궁궐이라는 특별하고도 역사적인 공간을 결합하니 신선하고 다른 것보다도 더 흥미로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창작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해외 공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지은(이화여대 교육 1): 저도 스토리나 배경 뿐 아니라 드라마 속 음악이나 의상도 진짜 예뻤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그 드라마에서는 두 번째 달이라는 퓨전 밴드가 민속적인 가락으로 만든 ost 가 삽입되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드라마에 나왔던 현대식으로 변형한 한복의 색감도 정말 예뻐서 드라마를 보는 동안 한복의 매력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퓨전을 활용해서 만든 본받을만한 사례입니다.

조유진(이화여대 교육 1): 저 역시 지은 학우가 말한 것처럼 전통 그 자체만 고수하려고 하기보단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현대적으로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혜(이화여대 교육 2): 하지만 전통적인 느낌을 너무 해치지는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느낌을 받았을 때 관광객들이 과거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으며 그 문화유산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가면 엄숙해지는 느낌도 필요한데 너무 예쁘게만 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제대로 된 감동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이화여대 교육 1):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전에 어떤 다큐에서 대영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일본 등에서는 입장료를 많이 받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무료입장 혹은 너무 싼 입장료 때문에 문화유산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며 한 교수님께서 비판하신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일화 중에 우리나라에 일본인 관광객이 왔는데 입장료가 1000 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1000 엔을 내려고 했다는 것을 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우리만 우리 것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리랑 같은 우리 것에 대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우리 문화를 멸시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스스로 문화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국에서는 국민들의 호응도 많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우리부터 안에서 관심을 키워나가야 세계화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유진(이화여대 교육 1): 그 가치를 알고 즐길 만한 여유가 사실 학생 때는 없습니다. 학생 때부터 우리나라의 문화를 접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고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공부만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지 학생들은 방법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수빈(이화여대 교육 1): 저 역시 얼마 전에 세계문화유산에 농악이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곧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부터 관심을 가져야지 세계화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유진(이화여대 교육 1): 대학생들도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에도 한복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번 만우절 날 그 동아리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것처럼 대학생들끼리라도 한복 입는 날을 하루 만드는 것도 색다를 것 같습니다. 한복 값이 비싸서 문제긴 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요?

이지은(이화여대 교육 1): 저는 구체적으로 홍보 방법을 논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 차원에서 따로 부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관리나 홍보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과거의 숭례문 화재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유진(이화여대 교육 1): 저 역시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앞서 국민들도 우리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의 세계화라고 하면 외국인한테만 알려준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교육하면서 좀 더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혜(이화여대 교육 2): 공감합니다. 대신 역사교육을 쉽게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pass or fail 형식으로 쉽게 만들되, 모두가 의무적으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우리의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종합해보자면 관련 부처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콘텐츠와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스토리텔링 식으로 설화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설사들의 질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시각화를 통한 홍보 방안도 고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홍보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도 관련 부처를 확립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어렸을 때부터 기초적인 역사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부터 우리 것에 대해 알고 사랑해야 문화유산의 세계화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아끼고 관심 가질 때, 세계인 역시 공감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⑤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문화유산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93차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이른 아침에 시간을 내준 여러분들의 오늘 연구모임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 월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문화유산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제 93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선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세계화에서 있어서 제일 큰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도 잘 모르는데 우리 문화를 세계화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우리 문화가 세계화를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각자 의견을 말한 후 여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의견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애착심이 필요하다.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우리나라 문화의 세계화를 도모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에 더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 문화에 신경 쓸 틈도 없이 우리 민족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빠졌기 때문이며 민주화 이후에야 문화 부분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걸음마를 땐 수준이며 우리 문화를 재활성화 하려면 4 가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4 가지 대책으로서 첫째 우리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리파인(REFINE)하는 작업, 둘째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셋째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넷째 교육과정에 우리문화 체험과정을 넣는 일입니다.

전통문화에 현대 디자인이나 기술을 입혀 낡았다는 인식을 타파하게 하고, 문화 종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맥이 끊기지 않게 하고,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대중들과 친숙해 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 교과 과정에 전통문화를 넣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와 친숙하게 해야 우리 문화의 재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박진호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 전통문화가 우리한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현 상황에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에 넣는 것은 좋지만 '들을 학생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취미로라도 할 생각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김승현 (부산대 지리학과) :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무조건 원형으로 보존하는 건 복고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중요한데 아직 국민들에겐 여유가 부족합니다.

박진호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 무형문화재의 생계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기술을 가져도 전수 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그 이유는 생계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형문화재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첫번째 의견에선 제가 4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고 그 대안의 의견으로 김승현 학우는 무조건 원형으로 보존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고, 박진호 학우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통 악기를 이용한 음원을 만들자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다음은 김승현 학우의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승현 (부산대 지리학과) : 샘플링이란 기존의 팝-클래식 음반의 연주 음원을 그대로 따서 쓰는 음악기법입니다. 현재 kpop 이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데 kpop 의 곡에 전통악기를 이용한 bgm 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악 외에도 디자인에도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드는 옷에 우리 전통문양이나 한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디자인을 사용한 옷으로 패션쇼를 열때 한국의 음악도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동건 (동아대 국문학과) : '샘플링보다 오마주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한류 컨텐츠 문화에 있어서 한류만 생각하면 전통문화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편중된 생각입니다. 우리 근대 현대문화도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의 문화가 퍼진 것은 중세양식을 고집하지 않고 현대적인 재해석을 했기 때문이며 다른 문화권이 그 문화에 녹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흑인 음악이 전파된 것도 그 안에 공백을 채울 여지가 있었기 대문이며 전통문화도 그 공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툴을 제공하고 현지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자산을 주고 그쪽에서 가꿀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입니다.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두 번째 의견은 음악이나 디자인 쪽에 우리 전통음악이나 전통 디자인을 넣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한 이동건 학우의 의견으로 샘플링보단 오마주가 더 나으며 원형을 보내지 말고 뼈대만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중성을 얻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다음은 박진호 학우의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박진호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 현 상황에선 세계화는 어렵습니다. 대중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중성이 없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대중성이 없으니 지원이 어렵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백그라운드가 서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반동으로 우리 것만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너무 전통이란 틀에 있지 말고 새로운 사고와 시각으로 창안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건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 동양 서양 문화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서양 차이 비교 분석해도 좋지만 문화수준 차이를 논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둘 다 포용해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범위만 축소해서 보았을 때 한국의 근대적인 가치 현대 문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2 년 월드컵 때 광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을 보고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렇듯 한국 특유의 정신적인 가치를 찾아서 알려야 합니다. 한국의 문화는 예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영역도 포함합니다. 서구 문명권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지만 한국 고유의 가치도 살아 있습니다.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세 번째 의견에선 아직은 무리이며 대중성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이를 해결하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동건 학우의 의견으로는 동서양 문명의 비교는 무의미하며 정신적 문화요소의 수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전략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마지막으로 이동건 학우의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동건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시스템을 수출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의 경우 각 국가마다 다릅니다. 시스템은 갖고 가되 그 나라에 맞추어서 영업합니다. 현지화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 나라에 맞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뼈대만 우리 것으로 하고 나머진 그 나라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맥도날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맥도날드의 마크만 보내고 메뉴는 현지인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맥도날드 각국 지점마다 파는 메뉴가 다른 것도 이 때문이며 각 국에서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 나라 입맛에 맞는 햄버거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맥도날드의 전략을 참고해야 합니다.

현지화를 하려면 폐쇄적인 기업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현지인력을 채용하지만 생산직으로 가며 r&d 채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진출에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려면 현지화가 필수입니다. 우리는 공급자이며 외국인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이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마지막 의견으로 시스템만 보내고 그 속을 그 나라 것으로 채우자는 의견이였습니다. 또한 기업문화의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모두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고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가 문화투자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출자라는 형식으로 간접 투자하고 방향만 잡아주는 것입니다. 간접투자로 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직접 나서면 '김치맨'과 같은 졸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자형식으로 해야 시장으로부터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 오늘 연구모임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으로 4 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⑥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우리 문화의 세계화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김한준(공주교대 4) : 지금부터 KELF(Korea Economy Leaders Federation)한국경제리더연합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 참석해주신 KELF 학우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한류열풍으로 우리문화의 세계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요나 드라마 같은 서구에서 유입된 대중문화가 중심이 되어 우리 전통문화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열풍의 지속과 문화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서는 대학생, 일반인 중심의 역사, 문화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정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문화동아리 활성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세계화 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동아리 활성화방안에 대한 학우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훈(인하대 경영 4) : 비전문적인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문화유산을 답사하거나, 체험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회사, 기관에서 관계자들이나 내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및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인센티브 투어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서 역사, 문화동아리 회원들을 초청해 우리 문화유산을 답사하거나 체험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강연을 실시한다면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역사, 문화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 문화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실시가 중요합니다.

김한준(공주교대 4) : 실제로 League of Legend 로 유명한 미국의 유명 게임회사인 라이엇 게임즈에서는 문화재청과 연계해 우리나라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성균관 제례를 체험하는 활동을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인센티브 투어를 역사, 문화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분명 역사, 문화 동아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반석(명지대 경제 3) : 정부와 지자체가 대학생 역사, 문화동아리와 연계하여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KELF 의 경우 자유경제원과 연계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멘토링을 실시해 올바른 경제지식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문화에 관해서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학생 동아리에 문화유산 관련 교육을 시키고 해당 대학생 동아리들이 중, 고등 학교 학생들에게 문화멘토링을 실시해 문화지식전수의 네트위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유경훈(인하대 경영 4) : 기존에 KELF 의 멘토링 시스템 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 문화동아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큐레이터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다희(명지대 경제 4) : 큐레이터라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물을 관리, 연구하거나 전시회를 기획, 홍보하는 전문 직종인데,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큐레이터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요?

유경훈(인하대 경영 4) : 큐레이터라고 해서 꼭 문화재를 연구, 관리하는 전문가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문화재나 박물관에서 안내 및 전시물 설명을 해주거나,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재를 관리, 보존하는데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문화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큐레이터를 육성해야 됩니다.

김한준(공주교대 4) : 최근 많은 교육동아리들이 있지만 대부분 교과교육이나 경제교육에만 치우쳐진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서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해 온라인으로 우리 문화재를 홍보하고 있지만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부족합니다.

문화재청이나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이 문화, 역사와 관련된 대학생 동아리나 일반 동아리와 연계해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학교에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유경훈 학우가 제시한 문화재 큐레이터 육성도 역사, 문화 동아리 회원들이 문화재 관리 및 보존현장에 참여하고 박물관이나 문화유산의 안내 및 홍보역할을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또한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및 관련기관과 문화, 역사 동아리와의 연계를 통해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SNS를 활용한 홍보방안을 논해는 것은 어떨까요?

유다희(명지대 경제 4) :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서 해외의 블로그 계정이나 페이스북을 활용해 SNS 홍보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문화, 역사 동아리 소속 학생들 중 영어에 능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문화유산 체험활동을 영문으로 해외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포스팅 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오반석(명지대 경제 3) :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서 영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개설하고, 연계된 동아리 회원들이 영문으로 직접 자신들의 체험을 포스팅한다면, 우리 한국사람들의 생생한 문화유산 체험을 들려줄 수 있어 홍보효과가 커질 것 같습니다.

김한준(공주교대 4) : 우리나라에도 영어 학습에 관심이 높거나, 영어에 능통한 대학생들이 많은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영문 블로그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대학생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체험담을 들려주는 방법도 실효성도 높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체험을 게시하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동아리 회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문화유산 답사 및 체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모전을 활용해는 것도 해내의 방법해 될 수 였습니다.

오반석(명지대 경제 3) :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외에도 역사, 문화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UCC 를 제작하거나, 영문으로 문화유산 체험기를 작성하는 공모전을 실시해 수상작들을 유투브나 구글에 게시한다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고, 문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김한준(공주교대 4) : 최근 많은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UCC 를 제작하거나 영문 문화유산 체험기를 작성하는 공모전을 실시한다면 분명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있어 가장 먼저 문화재 답사, 교육프로그램 마련, 문화재 보존 및 홍보활동 참여 등 역사, 문화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관련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역사, 문화 동아리의 문화유산 멘토링 지원활동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촉매제의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나라도 진정한 문화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준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선진국이 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2 차 KELF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⑦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명동회관에서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원탁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지금부터 원광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세계화는 더욱 진행되고 있으며 같은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이 비슷한 문화유산으로 국가 간 갈등을 겪고 서로의 것을 원조라고 말하며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인정받기 위해서 세계에서도 인정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 월 26 일에 한국선진화포럼에서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방안과 문화유산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정(원광대 역사교육 3): 문화유산이라 하면 당연히 아끼고 보호해야 할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화유산이라 하면 고리타분해 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문화유산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를 보면 어렸을 때는 흥미 위주로 교육하고 고학력이 될 수록 토론 식으로 교육을 한다 합니다. 우리도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이런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문화재청쪽에서도 캠페인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방화로 인해 한번 전소가 되었었던 숭례문

이희주(원광대 국제통상 2): 숭례문 전소사건을 보듯이 우리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기 위해 BTL(커뮤니케이션 홍보)방식으로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두 학우의 의견에 공감하며 저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최민정 학우께서 말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제도적으로 더욱더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호방안 중 하나로 문화유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보통 문화유산 전문가하면 큐레이터를 떠올릴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론 이 큐레이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역사에 관심이 높아지며 큐레이터의 양성도 중요해지고 있다

최민정(원광대 역사교육 3): 박재형 학우 말대로 큐레이터 고용률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갈수록 문화유산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적 지식이 가진사람들이 많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방안을 말하자면 국가가 문화유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봅니다. 이번에 발생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소실된 사건을 보면 개인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가 훼손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국가가 좀 더 철저히 관리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희주:(원광대 국제통상 2): 저도 문화유산의 보호를 제도적인 방안에서 접근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의 훼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놀러가서 자신이 놀러갔음을 기념하는 낙서도 하고 쓰레기도 아무 곳이나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처벌을 강화하면 이러한 일들이 줄면서 자연적으로 보호가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검사기간을 더 빈번히 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해 교육적인 방안과 제도적인 방안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화유산 세계화 방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요?

이희주(원광대 국제통상 2): 문화유산의 세계화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적극적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문제는 이웃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중국국적의 여행가이드를 채용했는데 그 가이드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여 알려주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인식과 문화유산 인식이 잘못되고 있다 합니다.

서양의 먼나라부터가 아닌 가까운 나라부터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제대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학습은 교육에 있어서 대우 중요한 부분이다

최민정(원광대 역사교육 3): 세계화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부터 재편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 되어오고 있는데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의 문화재 탐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동아리로 향토연구역사동아리를 했었는데 2 주에 한

번씩 탐방도하고 수업시간에 이해도 잘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희주(원광대 국제통상 2): 저는 세계화에 있어 해외에 우리의 문화재가 많은걸로 아는데 문화재 회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추진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 문화유산 우리가 보존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저는 문화유산을 실용적인 기술과 결합하여 아이템화 하는 것도 세계화에 있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최민정(원광대 역사교육 3): 박재형 학우의 말에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유산에 관한 아이템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치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강조하는 기념품이 많은데 소득도 중요하지만 세계화를 위해서면 한국적인 이미지를 정하고 그것에 관한 기념품을 문화재청에서 박물관에 뿌려 동일한 제품으로 줄 수 있게하거나 팔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문화체험을 홍보하는 것도 외국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이희주(원광대 국제통상 2): 저는 스키캠프 같이 문화유산도 캠프식으로 해보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캠프를 개최하여 문화유산을 자세히 알고 며칠 간 문화유산과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것을 외국인에게 패키지 상품으로 내놓는 것은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정(원광대 역사교육 3): 국가가 궁이라던지 한옥을 사서 저렴하게 대여를 해주는게 좋을거 같다 생각해봅니다. 또한 유명한 역사학자,역사교수 같은 전문가들을 데리고 월마다 정해서 지역별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홍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유튜브 최초 20억뷰를 돌파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저는 문화유산의 세계화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면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서 대박이 나온것처럼 동영상 등을 재밌고 유익하게 찍어 외국인들의 관심을 높이면 세계화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정(원광대 국제통상 3): 문화유산 세계화에 있어 문화유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좋을거라 생각하며 또한 요즘 해외에서도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웹툰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번역된 우리 웹툰을 보면 잘못 번역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웹툰으로 문화유산 관련 내용을 만들시 간단하게 에피소드식으로 하고 번역을 국가에서 주도해야 합니다.



예능에 역사와 문화유산을 접목시켜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이희주(원광대 국제통상 2): 문화유산에 관한 예능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즘 해외로 우리나라 TV 예능이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능에서 역사교육에 관한 기획으로 엄청난 호평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유산에 관한 예능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은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해 보았고 문화유산 보호방안과 구체적인 세계화 방안 등에 대해 나왔으며 웹툰, 예능 등을 예시를 들며 재치있는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문화유산의 세계화는 나부터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자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⑧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서원'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류 열풍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도 분명히 중요한 일인데요.

저는 이에 대한 소주제로써 “문화유산을 세계화시키기 위해 정부 및 국민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정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타버린 국보 제1호 '숭례문'

이정아(숙명여대 영어영문학): 저는 문화유산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의 국보 제 1 호인 남대문에 방화범이 불을 질러서 크게 훼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훼손된 문화유산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그만큼 우리 문화유산의 경쟁력과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문화재를 철저하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가 봅니다.

박홍근(홍익대 도시공학): 저도 문화유산 보호에 힘써아햐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랍권 국가들은 어떤 나라를 가고자 할 때에 그 나라와 관련된 책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대사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21 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저도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시위나 집회시에 문화재 근처로의 접근을 막는 법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서, 종종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문화재로부터 100m 내에서 시위 및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김정환(홍익대 토목공학):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국악과 같은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어릴 때부터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의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만,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우리의 것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김정환 학생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은 한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물론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우리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우리나라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아(숙명여대 영어영문학): 저는 문화유산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등을 제작하여 안으로는 우리의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밖으로는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의 시대에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문화유산인 프랑스 파리

박홍근(홍익대 도시공학): 이에 공감합니다. 저는 제가 아무래도 도시공학이다 보니까 도시를 개발하는 수업을 많이 듣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을 보면 도시 자체가 하나의 문화유산과 같이 도시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잘 느낄 수 있고 이는 큰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단지 어떠한 특정 문화유산만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지역 나아가 하나의 도시를 잘 보존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진행하여 더 큰 범위의 문화유산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환(홍익대 토목공학): 저는 앞으로 세계적인 뮤지컬 '캣츠'가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소리로 만든 '국악' 프로그램이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이에 대한 열악한 지원에 대해서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국악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퍼질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 이렇게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세계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 문화유산의 교육, 정보화시대에 맞는 홍보방안 및 한류를 이용한 문화유산의 홍보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 및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⑨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단국대학교에서 2차 선진화 연구모임이 열렸다.

백송희(단국대 무역 2) : 지금부터 단국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기간이라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흐름에 발 맞추어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의 열풍이 뜨겁게 일고 있는 지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우리의 문화를 온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가를 세계로 알리고 더 나아가 문화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에 힘 쓰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리랑과 김장문화 그리고 농악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정신문화를 지탱해주는 문화 유산에 대해 자국민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세계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재치 있는 twitter 활동으로 화제가 된 한국 민속촌

백송희(단국대 무역 2) : 우선 저는 사람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교과서 이외의 곳에서는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가장 접근이 쉽고 많이 노출 될 수 있는 sns 를 활용한다면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은홍 (단국대 무역 2) : sns 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방법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컨텐츠를 그리 오래, 그리고 깊에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등을 보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스크롤을 내려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 매체를 사용하려면 문화유산에 관한 컨텐츠를 짧게,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혜선 (단국대 무역 2) :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흥미가 동하지 않으면 아예 컨텐츠 자체를 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가독성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송희 (단국대 무역 2) : 네 저는 그래서 민속촌의 트위터를 보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민속촌의 트위터를 보면 항상 재치있게 트윗하여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트윗에 재미있다는 등의 반응과 함께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수진 (단국대 무역 2) : 저는 이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민속촌의 트위더가 그렇게 흥할 수 있었던 것은 민속촌 특유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성이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유형문화재는 sns 를 통해 널리 알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진(단국대 무역 2) : 저는 sns 는 일종의 소통 창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sns 의 활성화 방안도 좋지만 sns 에 알릴 수 있는 문화유산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혜선 : 저는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조금 더 늘려가는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송희(단국대 무역 2)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문혜선(단국대 무역 2) : 우리나라에는 큰 명절이 있죠. 추석과 설날만 되면 많은 체험 활동이 여기저기서 행해집니다. 따라서 저는 추석, 설날뿐 아니라 단오, 한식날 등등의 명절에도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sns 를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번의 체험이 더 뇌에 각인되는 것처럼 체험활동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윤수진(단국대 무역 2) : 문혜선 학우의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무료로 진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한다면 과연 우리의 문화유산을 가치있게 바라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궁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관광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허나 이를 완전히 무료로 개방한다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이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 누구의 접근도 차단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문화유산의 평가절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입장료 등을 조금 더 비싸게 받아 대신 가치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험활동의 질을 더 높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유형문화 유산을 더 많이 발굴하고 더 좋은 상태로 보존하며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홍보의 방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등의 가치있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은홍 (단국대 무역 2) : 저는 외국인 및 자국민이 체험활동시에 문화유산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sns 를 통해서 그 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거나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험활동에 동반하는 가이드가 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를 재미있게 소개하고 그 문화유산을 알리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만약 문화유산을 체험하는데 비용을 올리고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가이드의 재교육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백송희 (단국대 무역 2) :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형문화재나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했다면 과연 무형문화재는 어떻게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까요?



무형문화재와 한류 열풍을 잘 접목시켰던 국악 소녀시대.

윤수진(단국대 무역 2) : 이 역시도 컨텐츠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문화 같은 문화체험을 더욱 더 홍보하고 알려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신은홍 (단국대 무역 2) : 2010 년 경에 한창 '국악 소녀시대'의 돌풍이 일어났었습니다. 허나 이내 반짝하고 현재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와 문화재청과 연합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무형문화재를 현재 흥하고 있는 한류와 접목한다면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백송희(단국대 무역 2) :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개발하여 sns 에서 홍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필두로, sns 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을 알리고 이같은 프로그램을 sns 를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형문화재와 한류의 접목을 통해 문화유산을 세계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문화유산의 세계화 ' 를 주제로 제93차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송민상 (중앙 정치 3)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선진화 연구모임을 위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렸듯 지난 3 월 26 일에는 '문화유산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재)한국선진화포럼의 93 차 월례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프랑스 하면 에펠탑, 뉴욕하면 자유의 여신상,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등의 문화재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적인 차원에서 떠오르는 한국의 이미지는 한국 전쟁이나 경제개발과 같은 것들로서 구체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부재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는 무엇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범정부차원에서 문화재의 세계화를 위한 부처나 위원회를 설립한다면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폭 넓은 토의를 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신문화가 담겨있으면서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각적 이미지는 무엇이 있을까?

원선민 (중앙 중문 3) : 제가 중국 유학시절 중국인들에게 직접 들어보니 중국인이 한국에 가장 인상 깊어 하는 곳은 롯데월드, 코엑스 등 쇼핑위주의 볼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류나 쇼핑에 치중된 문화는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서 문화유산 홍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 관광객이 찾는 여행지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은 국토로 인해 경주 등 문화유산지와 거리가 가까우나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교토와 같이 수도가 아니지만 역사적 이유로 관관명소로 재조명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인(중앙 중문 3) : 문화재에 있어 외국인에게 연상되는 이미지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기가 다른 나라의 국기에 비해 굉장히 아름답고 세련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인이 주로 찾는 명동과 남산과 같은 지역에 태극기 박물관, 공원, 정원 등을 만들어 태극, 건, 곤 등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지음(중앙 영문 3) : 저 같은 경우 싱가포르에서 5 년 간 유학생활을 했는데요. 싱가포르하면 떠오르는 멀라이언(Merlion)의 경우 싱가포르가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설화를 차용해 허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국가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형상화시킨 사례입니다. 필요하다면 한국 역시 단군신화에서 차용하여 호랑이와 곰을 합쳐 국가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면 어떨까요? (일동 웃음)

원선민 (중앙 중문 3) : 좋은 생각이지만 싱가포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역사가 굉장히 유구한 편입니다. 물론, 싱가포르에 비해 국가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적은 것도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저는 독립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아직도 한국을 일본 아래의 나라라고 인식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독립에 대한 전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길(중앙 전전 3) :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독립을 전파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독립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는 미국.프랑스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독립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반만년의 역사에서 강대국 아래에서 특정 국가의 지배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주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파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민상 (중앙 정치 3) : 일제시절 고통 받은 역사를 숨길 필요만 있는 것만 아니라 서대문 형무소처럼 관광화로 하여 외국인에게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조계지나, 캐나다의 퀘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지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혜원 (중앙 중문 3) :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서대문구에 독립문이나 형무소가 밀집되어 있어 이 일대를 개발하여 관광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국 유학시절 대련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가 투옥되었던 여순 감옥에 방문하였는데요, 정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 매우 놀랐고 사형을 시키는 과정 등을 생생히 볼 수 있게 시각화 해놓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중국인이 일제의 고통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더 나아가 이를 관광자원화 한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원 (중앙 물류 2) : 한편, 영국의 신사,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처럼 우리의 선비정신(성균관)도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도하고 대쪽 같은 정신을 서원들과 연계시켜 시각적 이미지화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길 (중앙 전전 3) : 한국의 드라마틱한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발전의

거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 발전 상태를 한강이나 인사동 등지에 체험촌을 만들어 활용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민상 (중앙 정치 3) : 중국의 경우 국가 문물국(国家文物局) 산하에 세계 유산처(世界遗产处)를 설립하고, 공자학당을 전파하는 등의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자국 문화재의 세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논점을 전환하여 이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유수한 시각적 이미지(문화재)의 세계화를 전담할 정부부처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망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은 이미 충분히 포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재 역시 매년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도 문화재와 우리 역사에 대해 알리고 기존의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 획기적으로 유엔 출신이나, 루부르 박물관 소장과 같은 외국 전문가를 영입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시각이 아닌 해외인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세계화가 가능한 문화유산이 어떤 것인지 제 3 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호길 (중앙 전전 3) :각 부처의 홍보부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국 동북공정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이 무슨 노력을 대체 하고 있는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국민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부의 노력에 관한 홍보활동이 부족합니다.

신혜원 (중앙 중문 3) : 한국에 오는 외국인 대부분이 젊은 대학생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에도 교환학생, 방문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따라서 학교마다 교환학생, 방문학생 전문 단체를 구성하여 문화를 소개하고, 언어를 교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통역관이나 각 국가 전문가 등을 대학 요청하면 정기적으로 방문해주는 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선민 (중앙 중문 3) : 공자학당의 경우 전세계에 440 개가 있고 우리나라의 세종학당의 경우 90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자학당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위치하고 있는데요, 특히 HSK 자격증 관리를 전담하며 고득점 획득 시 중국 유학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세종학당을 어학자격증과 연계시키고 외국인에게 한국 유학을 지원하는 등의 문화와 연계하여 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원 (중앙 물류 2) : 정부 기관에서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한 공모전을 장학금과 문화재 관련 부처로의 인턴 기회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공모전이 주로 기업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 영상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문화재의 가치를 잘 파악하고 있는 소양을 갖춘 인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선인 (중앙 중문 2) :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음식, 관습 등을 강제로 권유하는 문화도 고쳐나가는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양인을 무조건 미국인으로 간주하거나 동양인이나 조선족 등을 낮춰보는 시선도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류 등의 영향으로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데 우리는 실제 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광객에 만큼이라도 이들에 대한 시선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을 차이나타운이나 이태원처럼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신혜원 (중앙 중문 3) : 정부차원에서 문화재에 대한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만리장성, 자금성과 같이 잘 보존된 문화시설에 관한 입장료가 매우 비싼 수준이며, 국민들 역시 이곳에 입장하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입장료도 싸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자부심을 느끼지 않음. 실제, 이태리 유학생을 가이드해준 경험이 있는데 문화재 입장료가 왜 이렇게 저렴한지 물어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지음 (중앙 영문 3) : 정부차원에서 문화산업에 한국의 풍경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일본의 주요 지역을 그대로 배경으로 하여 만들 듯이 우리도 게임이나 영화 등지에 한국의 풍경을 삽입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벤져스와 같은 글로벌한 차원의 할리우드 영화 등의 배경으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원 (중앙 물류 2) : 우선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인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술이 굉장히 유명하며, 중국에서는 성형관광을 올 정도로 이미 성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첨단의술을 관광상품화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민상 (중앙 정치 3) : 한국으로 세계인들을 오게 하는 유인책으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레고랜드, 디즈니랜드처럼 글로벌한 차원에서 유명한 관광자원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전국 지자체에 있는 스키장과, 워터파크, 테마파크 등을 세계에 널리 알려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길 (중앙 전전 3) : 우표나 주화 등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는 낭비성, 사양성 산업에 대한 홍보 투자를 지양해 나가며 디지털화에 맞춰 홍보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 등재 시 카카오톡 로고나, 네이버 포탈 등지에 이를 홍보하는 그림을 기업의 로고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인 (중앙 중문 2) : 엄마손 김밥을 Mother's hands Kimbab 으로 표기해둔 음식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는 주요 문화재 및 식품 등의 번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비트박스와 가야금 협주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고전예술에 현대적 미를 첨가하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중앙 중문 3) : 중국의 경우 치파오가 매우 싸고 접근성이 좋음. 그러나 우리나라 한복은 접근성뿐만 아니라 가격 역시 매우 비싼 편입니다. 앞서 말한 이태리 친구를 가이드해줄 당시 거북선 모형을 사려고 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 그냥 돌아갔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 문화도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재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민상 (중앙 정치 3) :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정신문화와 이를 상징할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들에 대한 논의와 이를 세계로 전파할 정부 부처의 역할에 관해 폭넓은 토의를 나누어 봤습니다. 소중한 의견 내주신 참여자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⑪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무형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세계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송소담(서경대 공공 4): 지금부터 서경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귀한 시간 내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현재 저성장의 그늘 아래, 계층 간 갈등 심화와 청년실업 증가로 인하여 물질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세계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정신문화유산에 집중하면서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문화'를 통해 물질적 어려움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행복한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어떻게 하면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세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이 바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세계화시켜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콘텐츠'형식의 아이템이 인기를 끌며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유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존하고

세계화시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서경대 경영 3): 저도 '무형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세계화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과거 한국적인 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지 못한 시절에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유산'하면 무엇이 있는지 잘 몰랐고, 한국 고궁 견학을 통해 이를 경험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류열풍이 부는 시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알리는 것은 한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한국의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누구나 쉽게 접함으로써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쉽고 효율적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형신(서경대 공공 2): 저도 이제는 유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져 전 세계가 단일화되는 시대가 온 만큼, 보편적인 가치를 포함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유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소연(서경대 공공 4): 저도 물론 무형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세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해오던 '유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세계화시키는 것에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세계화에 치우쳐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소홀해진다면 이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것에 불과하단 것이죠.

송소담(서경대 공공 4): 물론 권소연 학우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유형문화유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이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세계화시켜야 할 시점이라는 데에는 여러분 모두가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세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적재산권의 확립'이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공재로 인식되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전승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적재산권을 통하여 이를 보호해주면 무형문화유산이 발굴되고 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의 브랜딩의 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전담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과 무형문화유산을 브랜딩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가치와 이미지를 심어 잠재적 수요를 만들어 주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수요를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것도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중국의 '세계유산처'와 같은 정부전담부서를 선정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신(서경대 공공 2): 저도 이와 비슷한 의견입니다. 사람들이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싶게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이 문화유산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권리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주고 이를 수렴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전담부서를 선정하여 관리·운영한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것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알리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크로스오버 형태로 전달하는 무형문화유산

권소연(서경대 공공 4): 저는 '무형문화유산의 크로스오버를 통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세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잘 알고, 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장르에 국한되기보다는 다른 장르를 혼합하여 이를 전달한다면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몇 년 전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이 뮤지컬은 발레와 힙합이라는 다른 장르를 섞어서 대중들에게 전달하면서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의 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이나 '국악'에 적용시킨다면, 아리랑이나 국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준희(서경대 경영 3): 저도 크로스오버적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형문화유산을 알리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 고유의 정신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소담(서경대 공공 4): 저는 추가로 명소에 무형문화유산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경복궁을 다녀왔는데,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경복궁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경복궁 내부에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아리랑이나 국악을 잔잔하게 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유형문화유산을 보러온 외국인들에게 유형문화유산도 알리고, 이와 더불어 무형문화유산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류열풍을 활용한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박준희(서경대 공공 3): 저는 한류열풍을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배경음악을 민요로 한다든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대장금'의 배경음악인 '오나라'가 민요적인 느낌을 주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민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서 도자기를 빚는 장면이 나와 한때 연인들이 도자기를 빚으러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을 드라마나 영화 속에 조금씩 노출시키면 위와 같이 한류열풍에 편승하여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소담(서경대 공공 4): 지금까지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세계화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해보았습니다. 그 방안으로 지적재산권의 확립과 세계유산처와 같은 정부전담부서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무형문화유산을 브랜딩시키자는 의견과 전승자의 권리를 존중해주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오버를 통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경복궁 내의 음식점에서 아리랑을 틀어주는 등, 무형문화유산을 노출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논의된 모든 것들은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이 행복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⑫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지난 3월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 93차월례토론회가 열렸다.

정우재(파이낸스경영 3) : 지금부터 한양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 월 26 일에 한국선진화포럼에서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한국 문화유산을 다른 나라에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전통문화에 익숙해질 것과 외국문화와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양문화를 더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곳곳에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여 익숙해지도록 하기, 토요일을 문화 현장 체험의 날로 지정하여 교육하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토리식 교육으로 흥미 불러일으키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문화유산을 발굴, 관리하는 것 만큼 다른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영상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핵심을 간결하게 전하고 흥미를 끄는데도 효과적이며, 중국과 아프리카의 사례처럼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세력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유정(철학 4) : 우리 문화와 문화유산을 세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익숙해질 것을 제시했는데 저도 이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세계로부터 우리의 문화유산이 인정을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문화가 대한 본질적인 공부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시대적 배경을 알 때에 비로소 그것에 대한 정당성 내지는 타당성, 우수성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중(경영 3) : 저는 문화유산에 익숙해지는 방안으로 대도시 곳곳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북촌 한옥마을과 경복궁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의 인기있는 장소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도 이곳을 방문하기를 즐겨합니다.

이 장소들이 인기있는 이유는 이곳이 우리 옛 문화의 '아름다움'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이는 이 장소는 우리 것의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우리 문화와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신뢰와 자긍심을 갖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의 첫 단계일 것입니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북촌 한옥마을

전욱진(사회학 3) : 우리가 문화 유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화 유산을 직접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서울에서는 경복궁, 덕수궁, 북촌 한옥마을을 가야 하고, 지방에는 특정 유원지를 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거주지, 학교, 병원 등의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한국적인 것을 찾아 보기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가지들에서도 한국적인 것을 찾아 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옛 문화유산들이 이미 세계화로 인해 서구화 되어 있고 우리 삶의 형태들, 그리고 구조들과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이고 이것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우재(파이낸스경영 3) : 저 역시 모든 학우분의 의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유정 학우가 제시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본질적인 공부와 역사 공부와 더불어 유럽의 사례와 같이 토요일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문화유산 현장에 직접 방문하면서 공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욱진 학우가 제시한 의견에 특히 공감이 가는데요. 저 역시 현대의 생활과는 맞지 않는 것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기 때문이고 거추장스럽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배척, 무관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전욱진(사회학 3) : 하지만 앞의 이유로 인해 우리 문화가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우리의 것을 찾고 느끼기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것들에 유용성을 더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는 살리되, 우리 현대의 삶에서 편하게 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전통의 미를 살리며 현대화 하는 것입니다.

이유정(철학 4) : 우리의 옛 것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합니다. 학문적인 부분으로서 철학적, 역사적 이해와 예술적 이해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 문화 곳곳에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양성은 전국민적을 대상으로하는 역사 문화적 교육을 통해서 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2008 년 숭례문 화재와 같은 사건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우리의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그 국민들 속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전문가가 양성될 때, 우리의 문화는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문화적 창조를 경험할 것입니다.



한국 문화유산 홍보에는 세계인에 눈을 사로잡을 감각적 디자인이 필요하다

김현중(경영 3) : 저는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널리 교류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리 문화를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분되는 '우리다움'을 알림으로써, 급변한 세계화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그 정체성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정(철학 4) :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러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외국어 안내방송이나 책자, 오디오 설명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료들 대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전문가를 양성하여 그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외국인 관광객,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을 문화유산에 대해 안내를 하는 것은 문화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과 소통하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국민 문화유산 프로젝트로 키워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정우재(파이낸스경영 3) : 한국인들이 한국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는 반면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유산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 정당성, 우수성을 알기 위해 우리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해 본질적인 공부가 필요하며,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신뢰와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가치는 살리되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을 더해야 된다는 의견, 문화전문가를 양성해 문화에 대한 익숙함과 외국과의 소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며 대학생들의 문화유산의 세계화 및 홍보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선진화 과제 14:

문화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제 81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우리 민족의 가락 아리랑, 이제는 세계의 가락으로

아리랑, 한민족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노래, 때로는 절절하게 때로는 흥겹게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 그 아리랑이 인류가 지켜야 할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 주년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의 노래를 넘어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노래로 성장한 아리랑을 통해 우리의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리랑이 민족의 가락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1926 년 제작된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일제 헌병에게 붙잡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영화의 마지막 대목과 주제가 '신 아리랑'이 함께 어우러지며 영화를 본 많은 민초들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후 민초들은 아리랑 가락에 나라 잃은 애환과 항일 정신을 실어 노래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순간에 언제나 함께하는 대표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에는 아리랑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인의 마음에 호소할 수 있도록 재창조된 현대적인 아리랑을 선보이기 위해 다채로운 공연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무대에서 아리랑이 공연되고 있고 많은 세계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알리며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리랑은 각 지역과 세대별로 재창조되고 전승되어서 현재 남북을 모두 합해 70 여종의 노래와 6 천 수 이상의 노랫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아리랑이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노래이자 유산이 된 이유는 단지 노래 자체의 특별함이나 노래가 창출해 내는 경제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고개를 넘어 희망으로 가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시대정신과 민족적 연대를 더욱 고취시켰다는 정신적인 가치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도 매우 훌륭하다고 합니다. 한류라는 신드롬까지 나올 정도로 드라마나 K-POP 의 상품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지표가 우리의 문화가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드라마나 K-POP 이 반세기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교훈과 의미를 남겨줄 수 있을까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문화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된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정부와 다수의 문화 산업 관계자들은 문화의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상업적 목적에만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유희와 소비에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또 다른 역할은 사회에 건전한 시대정신을 일깨워 시민들의 마음의 연대를 조성하고 그들이 사회와 소통하며 생각의 역량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 가락이 시대의 모습과 정신을 비춰주며 우리 민족의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고 전사회적인 공감을 이끌어 냈던 것처럼 말이죠.

문화의 발전과 융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때에, 소비되는 문화가 아닌 정신적인 유산으로 오랫동안 축적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에 문화의 선진화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세대의 시대정신을 일깨워주고 후 세대의 정신적 유산이자 교훈이 될 수 있는 문화 컨텐츠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봅니다.

②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문화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존속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문화는 한 민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지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주의 문화, 서구 문화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문화 사대 풍조 등으로 한국 고유의 문화를 살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이전 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들 중 하나로 한국사 의무 교육 강화를 예를 들을 수 있는데 문화 자체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사에서 배우게 되는 우리 고유의 역사적 산물들과 현대 시대와 연결고리를 맺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현대 문화와 한국 고유문화를 창의적으로 결합시켜 젊은이들에게 '한국 고유 문화'라는 어감이 주는 다소 고리타분한 rhetorical value 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유 문화를 현대 문화와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 사례로 예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궁'과 '성균관 스캔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문화와 전통문화의 결합을 통한 우리 문화계승.

두 드라마는 공통적으로 조선시대 궁궐문화와 자유분방한 젊은 남녀의 로맨스라는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시켜서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갤럽의 통계에 따르면 드라마 궁과 성균관 스캔들이 방영되었던 2006 년과 2010 년에 경복궁 등 서울의 고궁 내방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대 문화와 한국 전통문화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한국 문화의 계승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 보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를 융성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국 문화의 발전, 선진화에 대해 많은 용어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전세계인들의 기호에 맞는 글로벌 표준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범위를 좁혀서 논의해보겠습니다.

문화는 유형문화 외에도 무형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글로벌 표준 도달의 논의에서 무형문화적 측면 또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빨리'문화는 부정적 언론보도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우리 문화의 부정적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특정 process 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선천적 잠재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표, 문서 작업을 간단한 수식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의 함수 개발자가 한국 교포라는 사실과 맥킨지 등 유명 경영 컨설팅 회사에 한국 출신들이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아울러 60~70 년대 한강의 기적을 통해 산업화를 최단기간에 이룩한 전례를 보았을 때 '빨리빨리' 문화는 한민족이 세계적으로 차별화 할 수 있는 특화된 무형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무형문화를 정부가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긍정적으로 육성하면 생산 공정, 조직 관리 등 기존의 경영 process 를 창의, 혁신적으로 단순화 하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빨리빨리'문화가 이러한 방향으로 육성되어 한국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많이 생겨난다면 우리 문화가 글로벌 표준의 수준으로 등극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문화 선진화 과제는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 입니다.

③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한일 월드컵은 우리민족의 단결성과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었다.

지난 2002 년 한일월드컵을 기억하시나요? 온 국민이 약속이나 한 듯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나와 한마음 한 뜻으로 대한민국의 승리를 외쳤습니다. 붉은 빛의 거리응원은 우리민족의 단결성과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우리민족은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순수한 혈통의 백의 민족, 단일민족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오랜 시간 자랑스럽게만 여겨왔던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이제 대한민국 문화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급속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다문화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단일 민족국가들이 가진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해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단일문화권에서 벗어나 여러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문화와 융합하여 더욱 독창적인 문화를 선도해나가는 국가가 되어야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인식이 문화의 선진화를 가로 막고 있는데요.

문화의 선진화는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문화 융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문화의 원형을 지키되, 다른 문화를 받아 들여 더욱 발전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한국은 2000 년대 이후 국제결혼의 빈도가 높아져 다른 민족,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인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부정적 시각과 정서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져 왔습니다.

이는 세계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의 민족적 자부심이 이민족과 타인종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인데요.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또한 다문화주의를 외면하고 배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은 외국에서 한국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민족 내부에 자민족 중심주의가 내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중심이고 한국인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가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도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호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소통과 교류를 통해 더 발전된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에 대한 배려만 장려할 뿐, 그들 문화에 대한 수용이나 문화교류를 통해 더 발전된 문화를 이끌어 보려는 태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문화는 서로 소통하며 교류를 통해 사회구성원에게 정착되어가는 정신적, 물질적 산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지원도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차별의식과 편견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주민들은 한국의 다문화정책 제도가 점점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인의 인식 가운데 다문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선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문화만 전해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생과 소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화 과제 15:

법률문화의 선진화

(제 97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강유정(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불법자금 정치문제 등 현재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회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준법의식, 즉 우리 사회에 법률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선진화포럼은 제 97 차 월례토론회를 '법률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와 4 명의 토론자께서 대한민국이 법률문화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주셨습니다.

먼저 양삼승 변호사는 법률을 분명한 법과 고차원적인 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셨습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위반 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후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법적 가치가 대립하므로 국민들의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곽삼근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정의수호의 자세, 즉 법을 지키는 정신이 확산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정신을 기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봉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법제도의 후견적, 치유적 역할을 강조하며 법률의 정의가 무엇인지만 따졌을 시 피상적인 해결책 제시에만 머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각종 절차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명숙 변호사는 법이란 당대의 보편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법률 재개정을 통해 시대상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해외와의 비교검토, SNS 도입, 검사평가제도 등이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명성 변호사는 원칙에 따른 법집행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전관예우의 철폐 세 가지의 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수렴하는 등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세 가지의 선행이 필수적인 것이지요.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토론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처럼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방안들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한 편의주의적 법치의식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원칙에 따른 법집행을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는 의식과 법에 대한 신뢰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철저한 법규준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의 준법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편의주의적 법치의식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대한 처벌 이전에, 폴리스라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 즉 이를 대하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법을 지키도록 하는 준법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전달형 준법교육이 아닌 집회나 시위, 음주운전과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형 수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상황을 적용한 토론형 수업을 통해 단순한 법 암기에서 벗어나 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한 문화가 형성되면,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어 법에 대한 신뢰형성에 기여합니다.



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 또한 법률문화 선진화를 위한 선제조건이다.

법에 대한 신뢰라 하면 일차적으로는 판결에 대한 신뢰가 떠오릅니다. 사법부가 과연 합리적인 기준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지에 대한 불신 여부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판결에 대한 신뢰형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의 여러 가치를 수렴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 역할이 있으므로 이념적 대립이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15 명을 교사, 검찰관, 교수, 외교관, 행정관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하는 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판사 출신이 대법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사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현직법관이 행정부의 고위관료로 임명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정치와 연관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감소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만연한 편의주의적 법치의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준법의식이 정착되고 법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토론형 준법교육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사법부의 독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법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 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준법문화가 정착된다면 대한민국도 법률문화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② 공수진(광운대학교 행정학과)



법률문화의 선진화

최근 한국은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민 안전 문제부터 불법자금 정치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회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뒷받침하는 제도에 관한 국민호응의 부족과 시민의식의 부재가 이런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 같지 않나요?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97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법률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준법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법률질서의 기본을 세우고, 법률문화의 선진화와 함께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법률문화의 선진화라는 것은 기초 질서의 유지에 관하여서는 법 집행이 단호해야 하고, 생각과 이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포용적이고 남의 입장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칫 눈앞의 편리함과 경제적인 탐욕에 빠져서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곽삼근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정들이 어겨지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가 시급함을 지적했고, 서구 문화를 토대로 한 가족 관련 법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또한 남을 배려하는 정신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재판 방청, 교도소 견학 등을 통한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김봉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법제도의 후견적·치유적 역할 강화를 통해 법률 문화의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법이 시대상을 반영해야 하며 시대를 구성하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찰하며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법 자체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 사법부가 투명한 활동을 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를 주장했으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수렴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관예우를 철폐해야 법률 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법률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정의이고, 지켜야 할 법이 분명한 법을 어겼을 경우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며 무엇이 정의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보다 고차원적인 법에 관해서는 끊임 없는 토론과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끊임 없는 논의와 토론

한국의 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질서의 유지에 관하여서는 법 집행이 단호해야 합니다.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되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신뢰성, 정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회, 사법부의 투명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뇌물, 로비 활동으로 법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정된 법률이 보통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법이 시대상을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법률은 사회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1994 년 성수대교는 붕괴는 부실공사 때문이었습니다. 1995 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건설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부실공사, 규정에 대한 무시 때문에 1000 여 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건설안전규정을 준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태였습니다. 2014 년 세월호 사건의 경우 운항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이 더 커졌습니다. 차량의 적정 적재수는 85 대인데 148 대를 과적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원칙 준수, 규정 준수가 안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었더라면 반복되지 않을 사고들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어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머릿속에 새겨야 합니다. 엄정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또한 국민들의 준법 정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인리히 법칙은 1930 년대 초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H. W. 하인리히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재해에 대해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장한, '사고나 재난은 발생 전에 여러 차례의 징후가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징후에 관한 법칙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심각한 안전 사고가 1 건 일어나려면 그 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가 29 건,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이 300 건 정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징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과 관련된 사고 중에 경미한 사건들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한다면 선박과 관련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문제에서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대한 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준법정신입니다. CCTV 가 없는 곳에서는 과속을 하고,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보다는 편법을 가르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어겼을 시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의 제정부터 집행까지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이러한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높아진다면 한국이 보다 선진국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률과 관련한 각계각층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계각층 사람들의 노력

③ 권새암(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법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시위, 허위사실 유포를 막으려 할 때 법이 정당하지 않다며, 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주관에 따라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감탄고토'식의 법률문화가 상당히 퍼져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이런 법률문화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한국선진화포럼 제 97 차 월례토론회가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먼저 양삼승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는 법률문화의 선진화에 대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법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한 법, 나머지 하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불분명한 법입니다.

전자는 그 법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정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인간의 서로 대립되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는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분명한 법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아서, 법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계속해서 합리적인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해서 감정 상해하거나 고집 피우지 말고 양보와 타협을 해야 선진화가 이뤄집니다,

그 다음 곽삼근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회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법은 그 사회의 생활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과 타인을 배려하는 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충족시키는 기준이므로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사회가 안전해지고 정의로워집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에 맞도록,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김봉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법제도의 후견적, 치유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후견이란 미성년자와 같이 사회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한국은 가정 문제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는 심판기능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이나 입양사건, 소년범의 문제에서는 잘잘못만을 따질 게 아니라, 재판에 연관되어 있는 미성년자들이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상담, 교육 등의 후견, 치유적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절차능력, 항소권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아직 한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사사건에서 법률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법률이 그 시대상을 잘 반영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원칙에 따른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법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키지 않는 편의주의적 법치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다양화해야 하고, 전관예우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의주의적 법치의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주의적 법치의식은 주관적인 판단아래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기 쉽고, 법을 감정에 따라 주무르려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법률이 있고,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법률도 있습니다. 법률 또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분별하게 저항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청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이고,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법률문화를 선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기 생각과 어긋난다고 마구 위반하고 고집피우는 것은 어린아이의 수준과 같으며 선진 사회에 어울리지도 않는 독단적 태도입니다. 의견을 교류하며 차근차근 소통하고 논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편의주의적 법률문화를 막고 발전된 법률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우선 법에 대하여 친숙해져야 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을 개선해야 합니다. 법은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서는 법을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법에 적용되는 사상적 기초들만 배우고, 고등학교 시기에는 법과 정치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법에 관해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회에서 법의 어려운 내용들을 접하게 되니,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고 법의 내용을 알아듣는 것조차 힘듭니다.

또한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조차 배우지 않아 법이 자신을 구속하기만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법에 반발심만 강해지고 법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즉, 편의주의적 법률문화는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편의주의적 법률문화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법에 대한 불신일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의 구속력이 약하고 처벌도 약하다는 생각이 만연해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주의적 법률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위에 상관없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채명성 변호사가 말했듯이, 대법관들을 다양화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대법관들이 다양해지면 연고주의를 탈피하여 법의 독립적인 적용이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사법의 독립성이 강해지면 법의 공정한 적용으로 법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주의 법률문화를 바꾸기 위해 온정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온정주의는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온정주의 탈피는 합리적인 이성을 지녀야 가능하고 이를 기를 수 있는 것은 토론 문화의 정착입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이성적인 의사소통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법을 대하는 태도, '감탄고토'식 법률문화는 한국 사회의 발전, 한국의 선진화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법을 더 긴밀히 접하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며, 이성적인 토론 문화가 정착되면 편의주의 법률문화를 벗어나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④ 권혁찬(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대한민국 법률문화 선진화를 위해선 법에 대한 존경심부터 확립해야 한다.

작년 4 월, 선박 운행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선박이 침몰하여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고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고 1 년 뒤 개최된 추모시위는 폴리스 라인을 무시하고 경찰버스를 부수며 태극기마저 태우는 불법 폭력시위로 전락하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결여된 준법질서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선 오히려 법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것이 고지식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을 만큼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희미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해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선 지난 23 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법률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명사분들과 함께 제 9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양삼승 변호사의 '법률문화 선진화를 위해 기초질서 유지에 대해 법집행이 단호해야 하고 타인의 입장도 배려하며 자칫 눈앞의 편리함과 경제적인 탐욕에 빠져 정의의 실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발제 이후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곽삼근 교수는 법을 지키는 리걸 마인드의 정립과 확신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발언하였습니다. 시대에 따라 법도 달라져야 하지만 그 본질이나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법은 집단의 가치를 제시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유의 미풍양속을 보존, 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봉선 판사는 엄격한 법 집행도 필요하지만 법 제도의 후견적, 치유적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운영하여 법률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명숙 변호사역시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선 그 시대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정서나 가치를 잘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채명숙 변호사는 원칙에 따른 법 집행과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토론자인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집회·시위의 경우 이념대립으로 비화되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진영논리에 따라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법부에서도 관대한 처벌로 일관해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헌법 위에 떼법 있다'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비판은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렇게 법이나 재판에 감정이나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되는 현상은 우리사회의 법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키고 준법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선 사법부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사회의 법치를 다시 구현하고 무너진 준법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법부가 온전히 독립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법/행정/입법이 분리되어 있는 3 권 분립이라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선 사법부의 판사가 독립되지 않고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권이 특정 판사를 옹호 혹은 비판한다거나, 판사의 임기 이후 새로운 직책에 임명하거나 정치권으로 등용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사법부를 행정부나 입법부로 종속시킬 것입니다.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고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법관의 출세와 사법부의 독립은 반비례의 관계마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항상 법관에 대해서 날카로운 감시의 시선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국민들은 법 앞에 감정을 내세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감정이나 개인의 이해에 따라 판결이 휘둘린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고 공동체에 의한 인치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도 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만의 가치관, 정의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 법에 대한 존중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법에 관해서는 감정의 개입을 최대한 억누르고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법은 개인의 감정이나 가치관으로 해석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특히 사소한 것이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물론 법이 현실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바꿔나가야 하지만 그것 역시 마련된 제도와 법을 통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법을 제정할 당시에 그 시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나 가치를 얼마나 잘 반영한 것인지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의 이해만을 기준으로 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만을 요구하는 법은 오히려 법치를 훼손하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려면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한다면 입법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고민과 토론, 다양한 가치관과 의견을 모두 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법을 우러러보며 누구나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사회 법률문화의 선진화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⑤ 김다솜(건양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각자 법을 잘 지키면 법률문화의 선진화로 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싸울 때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법대로 하자”인데요, 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법치국가란 법에 의하여 통치되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시민들이 합의한 공통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곧 법은 잘잘못을 따지는 기준이 되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역할을 수행하여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이 법을 식당에서 주문하는 음식처럼, 기호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즉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와 같이 사회 불안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준법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법률질서의 기본을 세우고, 법률문화의 선진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자 지난 7 월 23 일, ‘법률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 9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맡았으며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주제 발표와 발제를 하였습니다. 양삼승 변호사는 “법에는 스스로 추구하는 바가 명백한 법과 무엇이 정의인지 이념적 대립의 여지가 있는 법이 있으며 전자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준법교육이, 후자에는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토론에서 곽삼근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집행을 엄격히 하여 사회질서의 혼란을 막고, 개인주의로의 변화에서 한국적 전통문화가 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법에서의 공익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봉선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판사는 법제도의 후견적 치유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각종 절차법에 대한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원칙에 따른 법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집회, 시위와 관련하여 편의주의적 법치의식이 만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전관예우의 철폐가 시급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공통된 가치이기

때문에 법이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지키는 그 시대의 시민들에게 법률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준법의식 내지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은 그 시대가 정한 약속이자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모범시민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답답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나부터 먼저'라는 의식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엄격하고 철저한 법집행과 처벌 역시 필요하지만, 준법의식이 어느 정도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반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규율하는 법을 만들 때는 그 시대의 가치를 잘 반영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드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을 가르칠 때 그 법의 가치. 즉 왜 이 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양보 없는 교통의식과 희미한 준법정신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데 소수의 사람만 법을 지키게 되면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은 교통질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부산에서는 차선을 바꿀 때 깜빡이를 켜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깜빡이를 켜면 한참 뒤에 있던 차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바짝 붙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깜빡이 없이 위험하게 운전하게 되고 교통질서는 엉망이 되며 나 자신에게도 피해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준법의식이 있어야 먼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올 수 있도록 양보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법에 대해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울 기회가 없는 어른들은 정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등 어떠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처벌과는 별개로 법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나부터 먼저'실천하는 법률문화

법은 국가를 떠받치는 기틀이기 때문에 법률의 선진화야말로 '한국 선진화'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준법의식이야말로 장차 이 법을 선진화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를 '나부터 먼저'로 바꿈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준법의식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시민이 많아진다면 우리나라의 법률문화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⑥ 김덕규(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사회를 바꾸는 법률문화의 선진화,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사회를 정의롭게 움직이는 틀인 법체계를 국민들이 바로 알고 지켜나간다면 준법의식이 깃든 법률문화의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합의이자 공통된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나라의 기초가 바로설 수 있을 것입니다.

7 월 23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97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주제로 대한민국이 선진 법치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삼승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2 가지의 법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정의인지 분명한 법입니다. 대부분의 법률이 이 범주에 속하는데, 정답이 분명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 준수가 범법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하고 어길 시 가혹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이 화두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것이 정의인지 모호한 법입니다. 이는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늘어나는데요, 국방의 의무와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는 경우, 즉 국방과 양심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의 충돌이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반대되는 이념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약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토론, 즉 소통을 통한 이해가 우리 법률문화의 선진화에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곽삼근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국 하와이대학교의 짐 데이토(Jim Dator) 교수의 '미래 사회, 인류의 나침반은 삼강오륜에 있다' 발언을 인용하며 인간의 도덕실천과 법집행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에 철저한 법집행은 필요하지만, 개인의 행동이 각자의 양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서구의 법 규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이 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로 계승될 수 있는 법의식을 제시했습니다.

김봉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법제도의 후견적, 치유적 역할을 가정법원을 주로 하여 제시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재판작용이 심판기능만을 중시한다면, 이혼, 입양, 파양 등의 가사사건 이후의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가 받는 정서적 상처가 방치되기에 가정의 근본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재판작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의 경우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법이기에, 사회가 변화하므로 법도 시대에 맞게 변화함을 제시했습니다. 변경된 법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지, 얼마나 큰 효용을 갖는지, 효율적 법 집행에 필요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개정된 법률에 대한 홍보와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법률 강화보다 국민의 인식 개선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의 경우 원칙에 따른 법집행,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전관예우의 철폐 등 우리나라의 법률 문화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법률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잉입법 문제 해결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과정은 법률안 입안, 국회법제실 검토, 법률안 비용추계의 3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몇 개의 문구나 숫자를 조정하거나, 한문을 한글로 바꾸는 등의 수법인 '일부개정안'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십 건의 법안이 쏟아지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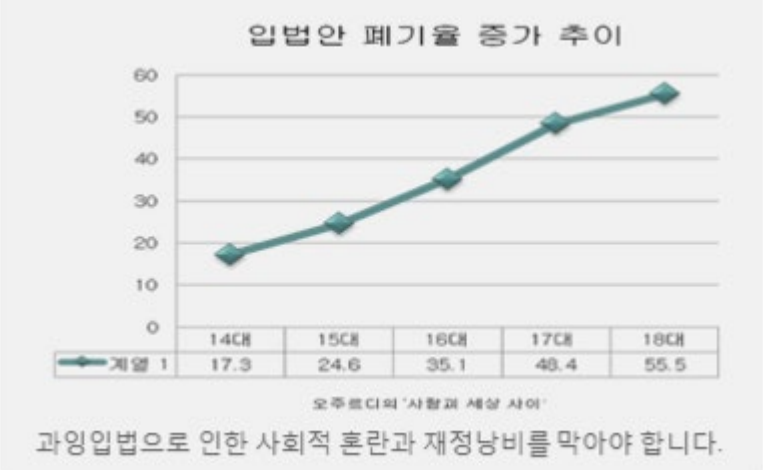
특히, 메르스 사태, 어린이집 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기존의 제정안에 문구 몇 개를 수정하여 '포퓰리즘 법안'을 양산하기 쉽습니다.

법안 개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많이 부족했기에 그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개수보다는 그 법안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입법과잉으로 '쓰레기 법안'이 양산되는 반면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법과 같이 꼭 필요한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입법 불균형이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선거철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며 우수 의원임을 입증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법안 개수를 통해 평가되고 때로는 지방의 단체나 시민단체의 압력에 의한 입법이 쏟아집니다. 입법 개수만 많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다수의 포퓰리즘 법안은 재정이 수반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함에도 우선 발의해 놓고 보자는 식의 법안 발의행태가 난무한 실정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낭비인 셈이지요.



올해 7 월 국회에 발의된 법안 수는 1 만 5 천여 건이지만, 이중 5 천여 건이 처리 되었고 1 만여 건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는 민주화 직후인 13 대 국회의 938 건과 비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8 대를 기준으로 한국 국회의원의 1 인당 연간 법안 발의는 13 여건, 의회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은 0.06 건입니다. 영국의 약 234 배에 해당하는 양이지요.

과연 이 많은 법안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재정적 어려움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따라서 새로운 법안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의 말씀은 과잉입법 문제를 해결하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과잉입법 때문에 법이 난잡해져서 국민들이 법을 모르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독일, 영국,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10 여 년 전부터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식 입법영향평가제도도 이제는 필요합니다.

2013 년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무분별한 의원입법을 개선하고자 입법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이 경우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또는, 15 대 국회에서 실시되었던 것처럼 양당에서 제출된 법안을 각 당 정책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진행해나가는 방안도 좋습니다.

양만 많다고 질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잉입법 문제를 해결하여 공신력도 높이고, 사회적 혼란과 재정 문제도 해결하여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⑦ 나종문(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최근 세월호 관련 각종 시위에서 폴리스 라인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거나, 불법 정치자금과 공직 비리 등 사회 전반적으로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비단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들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무단횡단이나,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는 등의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법률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준법정신 해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난 7 월 23 일, '선진화 포럼에서는 법률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 9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언자와 토론자들의 의견들은 모두가 다 흥미로운 의견들이었지만, 특히 양삼승 변호사의 의견이 특히 흥미롭고 공감하고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법은 2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켜야 할 정의, 법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법을 판단할 때 고차원적이고 인문학적인 소양이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는 등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절도 등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처럼, 일상생활에서도 확실하게 법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이를 확실하게 알면서도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면서 법을 어기는 등,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상황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법 행동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면, 법의 엄중함을 국민들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면,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의한 위법 행동들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법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률은 사회의 모든 부분에 관계되고 있는 만큼,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립되는 가치관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나 동성 결혼 등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사례들은 무엇이 법, 정의인지 쉽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토론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사회 문제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납득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의 토론문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인상깊었는데, 제 생각 역시 사법부나 법조계의 판단에 사회문제 모두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역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더 나은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생들부터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부터 서로간의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교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토론문화가 뿌리를 내릴 기반이 잘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연계해서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당장의 법률 문화의 선진화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도 선진화가 훌륭히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한 법을 집행하여 법의 엄중함을 다시 세우고, 토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우리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킨다면 선진화된 법률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문화의 선진화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⑧ 박상희(한성대학교 무역학과)


엄격한 법 집행과 준법정신은 법률문화의 선진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폭력, 강도, 살인 등 사회에 해가 되는 죄에 대한 처벌부터 교통법규, 의료법규, 환경법규 등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규율까지, 우리는 법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은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상위개념입니다.

최소한의 강제적 조치가 사람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97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법률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제시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률문화 선진화를 위해 질서 유지 논의와 준법의식 향상을 위한 대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발제자인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기초 질서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법 집행이 단호해야 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포용적인 태도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혼란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곽삼근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이 준수되기 위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개인주의적인 문화보다는 공동체주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법률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행과 편법이 아닌 자발적으로 엄격히 법을 지키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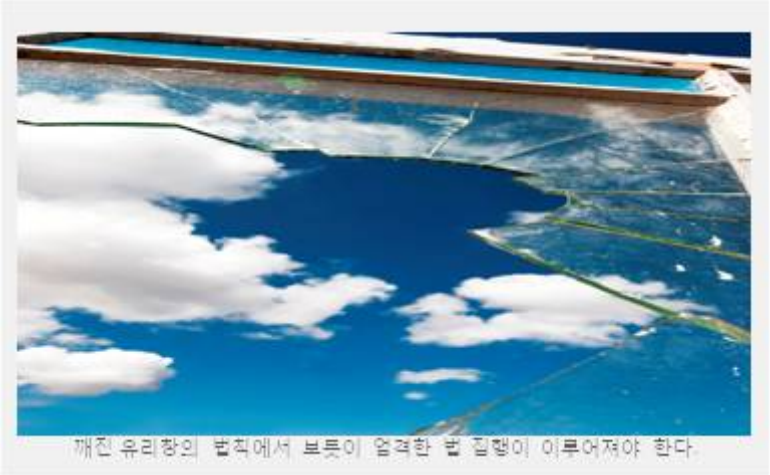
두 번째 토론자인 김봉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법제도의 후견적·치유적 역할 강화를 통해 의도치 않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혼판결을 낼 때 이혼으로 인한 자식의 정신적 피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법이 시대상을 반영해야 하므로 법이 낙후되지 않고 실효성을 위해 유동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의 준법의식 강조와 더불어 정당성 있는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수렴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관예우를 철폐해야 하며 원칙에 따른 집행이 선진화된 법률문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질서유지규정을 위한 시민의식 강화부터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문화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법의 중요성을 알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편의주의적인 법률의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목적의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법이 정당할 때는 지키지만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법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이는 철저한 법 집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보듯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범죄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다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주인이 건물에 대해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유리창도 깨뜨리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일수록 원칙에 따른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준법의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합니다. 살인, 강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영향을 끼쳐 또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법을 잘 몰라서" 또는 "어쩌다 실수로"법을 어겼다는 말에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며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어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다원화 될수록 이념적 대립에 대한 문제가 끊임 없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입니다.

1980 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86 명 중 판사 출신이 76 명일 정도로 판사출신 대법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게 되어 대법원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대법관의 절반을 검사, 변호사, 교수 등 비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관예우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특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개업하고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과도한 영리를 취하는 모습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종신법관제이고, 영국이나 홍콩은 법관으로 임명되면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법관이 퇴임하면 변호사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 년 개정된 변호사법을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시 퇴직 이전 1 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을 1 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을 법원이나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 공정위 및 경찰관서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징계를 하게 합니다. 실제 징계한 사례가 드물며, 처벌의 강도가 경미하여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법의 목적은 공익성을 지향해야 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의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정의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세가 법관에게는 필요합니다. 또 다른 법의 목적은 소외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법적 안전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의 목적을 되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우위에 두어 법률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두루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권력에 의한 법률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권력에 의한 법률문화는 적대감만 키우게 되며 결국 국민, 사법부 서로에게 신뢰 대신 불신만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모두를 위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 개인의 삶보다 모두에게 이로운 법치체계와 법률의식이 법률문화 선진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⑨ 송지나(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메르스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7 월 말, 올 봄과 여름 우리를 괴롭혔던 메르스의 종식 선언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사람도, 경제도 고통의 연속이었기에 사실상 종식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메르스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매우 속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보건당국, 국민들의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한 사투 속에서 보여진 우리의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은 너무나도 나약해 보입니다. 메르스 1 번 환자가 처음부터 중동에 다녀온 사실을 알렸더라면 감염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조치를 무시하고 출퇴근을 하거나 여행, 찜질방, 골프장에 다녀오거나, 여행취소권고를 받고도 중국 출장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 중국이나 홍콩등지에서 한국인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 변명조차 할 말이 없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의식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2009 년 신종플루로 인해 전쟁을 치르던 홍콩에서 격리대상인 외국인 중 유일하게 한국인 3 명이 조치를 거부해 한국 영사관 협조로 인해 겨우 격리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준법의식, 이대로라면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6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준법정신과 지금의 준법정신의 발전이 하등 다름없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준법의식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에 지난 7 월 23 일 한국선진화포럼은 사회불안이 팽배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질서와 준법의식을 강화해 사회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문화의 선진화'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양삼승 법무법인변호사는 "집회, 시위에서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공개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법치가 훼손됐다고 느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고 응징하는 모습이 진정한 법치"이므로 "시민의 준법정신 향상으로 선진화된 법률문화를 이룩하여 사회혼란을 막고 국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곽삼근 이화여대 교수는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사고 등은 법 집행이 엄격하지 못해 규칙준수보다 편법을 따르게 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토론자인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법이 정당할 때는 지키지만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의 편의주의적 법치의식이 만연해 있으며, 특히 집회, 시위의 경우 이념대립으로 비화되어 사법부에서도 관대한 처벌로 일관해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치의식이 견고히 세워져야 한다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치의식과 준법정신이 제대로 견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능률성,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는가는 깊이 고려해볼만한 문제입니다.

저는 법을 지키고 집행할 때 비용 및 시간손실이 발생하거나 유죄가 분명한 피고인을 심문하는 경우 혹은 선의의 목적인 법의 집행이라 할지라도, 그 법의 집행에 관해서는 편의적이고 경제, 효율을 따지는 자세는 경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법이라는 것은 존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국민대다수가 동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지켜야하는 주체는 우리 모두입니다. 또 그렇기에 법은, 법을 집행하는 기준과 주체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 집행의 능률과 경제성을 가르는 기준을 수립하기엔 너무나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법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이 세상에 법을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차별 적용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집회나 시위 등이 이루어질때도, 그것이 국민대다수가 분개하는 일이고 너무나 억울한 일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나치게 딱딱하고 융통성 없는 법으로 오히려 피해가 커지는 법의 모순을 피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역사적 뿌리를 바탕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궁극적인 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타인의 존중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위한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조차 엄격한 법의 적용이 없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법의 질서를 훼손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법'집행을 할 때 만큼은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감정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법률문화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⑩ 용지수(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작년의 세월호 참사와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불안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질서와 준법의식을 강화해 사회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나 메르스 관련 사태들은 모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안전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사회와 나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소한 규정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엄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23 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 '법률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법률문화의 기본을 세울지와 더불어 더 나아가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통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 양삼승 변호사는 선진국 사례를 들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가혹하리 만큼 철저히 보호하고 응징하는 모습이 진정한 법치"라면서 "시민의 준법의식 향상으로 선진화된 법률문화를 이룩해 사회혼란을 막고 국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 곽삼근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규칙준수가 안 돼 사회질서와 국민생명이 위협당한 대표적 사례는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사고 등"이라며 "이는 법 집행이 엄격하지 못해 규칙 준수보다 요행과 편법을 따르게 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김봉선 서울중앙지법원 판사는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이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 있다"며 "이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화의 후진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집회·시위 관련 범죄처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의 경우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전관예우를 철폐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법률이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찰해 보면서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닌지, 그 시대를

구성하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찰하며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합의이자 공통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이후 축첩제도를 뿌리 뽑기 위해 '간통법'을 만들었지만, 시대가 변하고 개인의 성적 자유에 대한 의식이 바뀌면서 얼마 전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진화된 법률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규율하는 법률을 잘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대상을 얼마나 잘 반영한 것인지, 너무 앞서거나 뒤떨어진 가치를 반영한 것은 아닌지, 또 대다수 국민들의 가치나 보편적인 정서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고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 제정에 있어서 국민 투표 제도를 적극 도입하거나, 미디어를 활용해 입법, 법 개정 과정을 공개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산다면 가능합니다. 국회는 국회방송이라는 전용 채널을 두어 입법과정을 공개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방송의 대다수 프로그램은 입법, 법 개정 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의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이에 국민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는 국민들도 법률에 대한 준법의식,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칠거지악이라고 해 마누라와 명태는 사흘에 한 번 씩 때려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 이 같은 행동은 가정폭력으로 처벌되고 손해배상 또한 해줘야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를 변화시키려면 관련 법률을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스스로 폭력을 없애고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인식을 변화하는 것이 법률 선진화의 또 다른 방법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재발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체계적인 교육, 회생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재범의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특별사면 등을 불가하게 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자, 특히 재범자 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

즉, 법률 선진화의 한 방법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자는 것인데요. 법률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입법, 법 개정 과정에서 시대상과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국민들이 법률을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켜 국민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면,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기본 토대가 잡히고, 국격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⑪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많은 사회 혼란 속에서 준법정신은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많은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 불안이 형성되면서 질서가 흐트러지고 준법정신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비단 준법정신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더욱 눈에 도드라지게 언론에 비췄을 뿐입니다. 배려가 없어서 준법정신이 부족해지고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찾을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저희 한국선진화포럼은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법률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제 97 차 월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법은 명확한 법과 모호한 법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발제를 맡으신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님의 의견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2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정의이고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분명한 것이 첫 번째 입니다. 두 번째는 고차원적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법인가의 판단에 인문학적 소양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문제에서 부딪히는 것들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킨다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치지 말 것, 남의 물건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교육과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에 대한 판단이 쉽게 서지 않는 법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관계되는 만큼 서로 대립되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종교의 자유 및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언론의 보도 기능 한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포용력 있는 사고'를 강조하셨고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곽삼근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님께서는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봉선 서울중앙지법법원 판사님께서는 '법제도의 후견적·치유적 역할'에 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기득권자의 논리에 따라 자칫 사회적 약자, 절차에서 침묵하거나 소외되어 있는 자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일반인의 준법의식 제고 필요성과 함께 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사법부의 고찰과 청렴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은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3 가지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첫 째는 원칙에 따른 철저한 법 집행, 둘째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마지막으로 법조계의 전관예우 철폐를 말씀하셨습니다.



토론 문화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들이 직접 초·중·고를 찾아가 위법 행위를 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와 준법 의식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 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쉽사리 결론짓기 어려운 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줌으로써 아이들의 사고력을 깊게 고양시키고 또한 토론 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사회에서 더 좋은 합의와 양보가 나올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를 대학들과 연계하여 정책으로써 시행한다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시민의식이 성립될 것이며 가르치는 대학생들 또한 다시 한 번 재정립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과 토론 문화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 주도하의 대학들과 연계해 프로그램화 한다면 정부, 대학생, 어린 학생들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법의식 교육과 토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우리의 준법정신이 고취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법률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선진 대한민국을 향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⑫ 조준상(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준법의식'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부족한 준법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민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요령과 편법을 통해 이를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최근처럼 시민들의 사회불안이 팽배해진 상태에서 이러한 낮은 준법의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법 자체에 대한 불신 또한 증가했으며, 법을 지키더라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타의적인 요소에 의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오늘날 준법의식의 현주소입니다.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주제로 한 제 97차 월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 포럼은 이러한 낮은 준법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7 월 23 일,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 9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월례토론회의 사회는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맡았으며,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주제 발표와 발제를 한 가운데, 곽삼근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봉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등 다양한 전문가 패널들 간의 의견 교류와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주제 발표와 발제를 맡은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법은 이념적 대립과 연관이 없는 분명한 법과 이념적 대립과 연관이 있는 고차원적인 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법집행이 단호해야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포용적이고 남의 입장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이 당장의 효율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본질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패널로 참여한 곽삼근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도 선진사회 인간이 지향해야 할 공통의 원칙은 존재하며, 법이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하였습니다.

또한, 김봉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포용과 배려의 연장선상에서 ‘법 제도의 후견적, 치유적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가정법원이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가사소송법, 소년법 등 각종 절차법에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선진화된 법률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률 재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하였으며,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원칙에 따른 법집행’,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전관예우의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법이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번 제 97 차 월례토론회는 법이 이러한 궁극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존수하는 태도로 준법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이치에 맞는 법일지라도, 정작 법의 적용 대상인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법률문화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준법의식 문제는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낮은 준법의식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은 편법이나 요행으로 법의 울타리로부터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에

대한 준수가 우리에게 훨씬 이익임을 알고,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태도로 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한 요행과 편법으로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종국에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침몰 등의 사고는 우리가 적정선을 넘어 당장의 효율성과 이익을 추구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국가적인 재앙이 초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손익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장기적으로는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보다 훨씬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을 타의에 의한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답답하거나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라 모범적이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고 준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수호해주는 보호막을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법에 대한 준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의 궁극적인 역할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우리의 준법의식 태도가 견지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법치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⑬ 최민경(고려대학교 정경학부)



법이란 무엇일까?

법은 왜 존재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익성의 측면으로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안전,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를 보더라도 안정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일들이 많죠?

대한민국의 법률문화가 선진화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법을 당연히 여기고 지켜가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의 이념적 대립에 포용력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법을 잘 지키는 선진화된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교육입니다. “몰라서 그랬어!”라는 말은 법을 어겼을 시에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변명이 되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규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법을 어겼을 시의 엄격한 처벌입니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나 혼자만 법을 지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지켜야 하고 서로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법의 준수를 강제적으로나마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처벌의 존재가 아닐까요?

마지막은 바로, 보다 고차원적인 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및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양심과 법의 대립문제, 언론의 자유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문제, 동성 간의 결혼 허용문제 등 법이 이념적 대립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야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포용력 있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옳다고 여겨지는 절대적인 법을 바라는 것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에서 등의 범위를 제한하여 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론의 일반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숙고와 선택의 과정에서 토론과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중요 현안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이 더 격렬하다고 합니다. 만장일치 혹은 근소한 소수의 의견만 보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경제성, 효율성 위주의 사고방식은 법률 분야에서는 경계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자칫 눈앞의 편리함과 경제적인 탐욕에 빠져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탐욕을 억제하는 마음가짐과 함께 법 자체의 의미에 대한 발전도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이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⑭ 최현수(홍익대학교 예술학과)



법은 사회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한 나라와 그 나라의 국민의 품격과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단순히 명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체로서 존재하며, 사회적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7 월 23 일, 명동은행회관에서 진행된 한국선진화포럼 제 97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법률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변호사님들과 판사님, 교수님들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법을 통한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분명해 보이는 법입니다. 이는 상식과 합리성에 토대를 둔 법으로서 무엇이 정의인가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미 알려진 정의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은 무엇이 정의이고, 어떤 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가 분명하고 큰 의혹이 없는 법들입니다. 이러한 법은 사회적 기반으로서 공동체의 원활한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이러한 스스로 분명해 보이는 법도 법률문화의 선진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에 대한 문화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질서와 타인에 대한 배려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의 큰 의혹이 없으며, 많은 대중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법률문화의 선진화 방안은?

두 번째로는 보다 고차원적인 법" 입니다. 고차원적인 법에서의 특징은 법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립되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관련된 법들은 단순히 합리성에만 토대를 둔 법이 아닙니다. 여러 정치적 결단과 역사, 또한 발전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장애인문제 등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과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어 왔고, 국민적, 역사적 결단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문화의 선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법, 보다 고차원적인 법에 있어서의 법률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고차원적인 법의 법률문화를 선진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론 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문화의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남과 나의 의견을 교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때의 토론문화는 입법과정에서부터 집행, 검토까지의 과정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법은 우리 생활과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많은 교류와 토론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토론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법률문화에 대한 많은 대화와 논의를 나누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우리나라의 법률문화가 좀 더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론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떤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담론과 기준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토론과정에서 양보와 합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과열될 수 있는 토론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양보와 합의의 태도를 통해 더 나은 토론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법률문화의 선진화는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활발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법률문화가 선진화된다면 사회 전체가 선진화되는 선순환의 구조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권새암 (경제 1):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민정서법을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국민정서법이란 무엇인가? 백과사전에 따르면, 국민정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국민정서법이라고 부르며 이는 실정법이 아닌 불문율입니다. 국민정서법은 여론에 의지하는 감성적 법으로, 이는 떼법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정서법이 소위 헌법 위의 법이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 비리 같은 문제는 엄청난 공분을 사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비난받습니다

이것만 보면 국민정서법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을 강력하게 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국민의 분노가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이고,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정서법은 한국 사회에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국민정서법을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웅 (인문 1): 저희는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국민정서법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4 년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떼법 논쟁이 일었는데요, 당시 여론은 세월호 특별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격해지면서 적절하지 못한 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SNS 등의 매체 발달로 특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되면서 여론이 한 쪽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점점 국민정서의 위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정서가 꼭 올바른 방향으로만 작용되는지는 의문입니다

.

첫 번째 근거로, 일시적 국민정서로 인해 잘못된 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군중들이 빨리 끓고 빨리 식는 현상을 두고 냄비 근성이라고 부를 만큼, 국민정서는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국민정서로 인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안을 폐지하게 된다면 헌법보다 국민정서가 중요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을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오랜 기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둘 째, 국민정서법은 법이 차별되게 적용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그맨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정희가 포로와 같은 결혼 생활을 보냈다는 증언에 많은 사람들이 서정희를 동정하게 되었고 SNS 에서 서세원에게 내려진 판결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동정으로 과도한 형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좋다, 나쁘다는 인식으로 차별적인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셋 째, 국민정서법이 특정 세력에게 악용당해 헌법 정신에 반하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 당시 애국자 법을 제정하여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격앙된 국민 정서를 이용하여 자유를 탄압하는 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여론을 잘만 이용한다면 특정 세력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죄형 법정주의 국가라면. 국민정서법을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새암 (경제 1) :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의 입론을 듣겠습니다.

이수진 (경제 1) : 국민정서법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째,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법이 적용되기 힘든 상황이 존재합니다. 현실은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을 인정하여 사회 관습과 생각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법적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째, 법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다수의 의견 존중을 국민정서법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셋 째, 법적 판결문은 국민정서법에 의해 압박만 받을 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정서법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권새암 (경제)1 : 네, 입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각자 입론 내용을 토대로, 반론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우 (경제 1):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문화의 선진화가 중요하고, 일시적 국민정서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국민정서법의 존재가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발제에서 제시되었듯이, 국민정서법은 불문율적인 것을 상식적으로 지칭하는 것일 뿐이며. 국민정서법에 따라 법이 제정되는 것은 국회의 판단이고, 법의 적용은 사법부의 주체들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국민정서법은 그 당시의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김윤수 (인문 1):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진 법률문화에 대해서,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고 그 정해진 법 안에서 해석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국민정서법이 옆에서 계속 압박을 주게 되면, 선진 법률문화로 가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정서법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압박만 줄 뿐이므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굉장히 책임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들끓고 '뭐 해라, 뭐해라'하다가 나중에 무언가 잘못되면, '나는 알 바 아니다'라고 하면서 빠져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김동희 (인문 1): 보충반론을 하겠습니다. 법률문화 선진화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 팀께서는 법률문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법률문화는 법률의 집행, 입법 진행 과정, 국민들의 법치의식까지 포함하는 문화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체계는 어느 법체계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한국의 법체계는 대륙법(독일계)를 따라가고 있는데 약간의 판례 참고를 통해 영미법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반대 팀은 국민정서법의 압박을 통해 여론의 현주소를 알게 한다고 말씀해주셨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불문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민정서법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경제적 소모를 너무 크게 만듭니다. 이것은 국민정서법이 무책임하다는 맥락과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악용 가능성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반대 측에서는 국민정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80%가 동의해야 하고 뭐, 그런 기준을 제시하시나요? 국민정서는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국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정의하기 힘든 시기에 국민정서는 어디까지로 정의해야 하는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그 국민정서를 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김상우 (경제 1): 국민정서법으로 인한 한국 법체계에 큰 타격을 말해주셨는데, 그 타격의 실질적 영향은 국회나 사법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이 강제성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법률문화 선진화를 위한 국민정서법 인정이라는 것은 마치 국민정서법을 인정하여 법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정서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법체계가 대륙법의 성문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셨는데요, 현재 한국이 성문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서 성문법을 무조건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성문법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결국 그 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사회 질서가 잘 구현되도록 해야 하므로, 성문법과 불문법을 잘 조합하여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정서가 모호하다는 것에 관하여, 결국 어떤 의견이 나오면, 소수이든 다수이든 그것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국민정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오는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려 대상이고, 소재로서의 국민정서는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국민정서법이 의미 있는 것이고,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윤수 (인문 1) : 방금 해주신 말이, 국민정서법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여론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대중매체에 의해 매우 좌지우지되고 특히 SNS 같은 것은 영향력이 크잖습니까? 세 모자 사건 같은 것도 한 번에 크게 터지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중매체 이용자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고 중장년 층의 생각은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단정할 수 없지만 언론 뒤에 정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에 따르면, 외부 세력의 이익을 위해 여론 몰이가 일어날 경우 국민정서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잘못 흘러가면, 이를 다시 돌리기에는 큰 경제적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은 선진 법률문화를 위해서는 좋지만은 않습니다.

김동희 (인문 1): 아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지향하고 있는데, 조선이 개화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일본을 통해 독일법을 받아들이면서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법률문화의 가장 문제점은 법 문화와 법 규범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법 규범 같은 경우는 서구 법의 강제 투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급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법 규범이 국민들의 전통적이고 비법적인 성격, 특히 법의 보복성과 많이 충돌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법에 대한 보복성 중심 태도 때문이더라도, 국민정서법이 인정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국민정서법의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토론 주제는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인정하지 말아야 하느냐입니다. 물론 저희도 국민정서법의 가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국민정서법을 인정하게 되면 편의주의적 법치의식이 만연하게 되고 이것은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막기 때문에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국민정서법은 기존의 법체계에서 약간의 영향, 혹은 국민의 정서를 알려줄 뿐이지 그것이 완벽하게 법체계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와 사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한국의 국민정서법의 예시를 보면 현재 헌법 위의 국민정서법, 떼법이 있다고 말할 만큼 국민정서법이 많은 영향을 미치며, 법이 의결되는 과정에서도 경제적 소모가 많습니다. 국민정서법은 분명 가치는 있지만 법률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인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선아 (경제 1): 국민정서법을 완전히 따르기보다는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자체가 사회의 변화를 뒤따라가기에는 느립니다. 그런 것을 보충하는 데에 국민정서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초등학생, 중학생과 관계를 맺은 교사에게 징역 6 년밖에 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실정법이 사회 변화를 뒤따라가는 데에 느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정서법이 법률의 이러한 면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국민정서법에도 물론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를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지, 국민정서법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동희 (인문 1): 그런 제도적 장치로 생각해보신 것이 있나요?

이선아 (경제 1): 국민과 고위급 관리들의 회의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국민정서법을 인정하지 않기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보는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수 (인문 1):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이상적이고 좋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국민과 고위급 관리의 회의는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고, 따라서 제도적 장치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진 (경제 1): 찬성 측에서는 냄비 근성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가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국민들이 나름 바쁜 생활 속에서 여론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냄비 근성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이것은 정치 체제 때문이지, 의견 표출 자체만으로 비난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새암 (경제 1): 네. 오늘 법률문화 선진화, 그리고 국민정서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찬반 측의 논거,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정서법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악용될 수 있으며, 잘못되더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서 문제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민정서법이 경직된 법을 유연하게 만들거나 여론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는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나종문 (미디어 2):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부족한 준법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법과 질서를 자발적으로 지키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요령과 편법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고려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주제로 시민들에게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민경윤 (미디어 2): 우선,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의 권위가 실추된 것이 국민들의 준법인식이 낮아지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겨도 이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법을 어기는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이 앞장서서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알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기관들은 대학생을 통해 법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준법정신을 고취하려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훌륭하게 사회에 준법 정신을 고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건 (미디어 2): 저는 민경윤 학우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우선 대학생들부터 준법정신을 고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준법 해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대학생이라고 이에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개인이 법에 대해 교육을 받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는다면 법을 공부할 기회를 접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학부만 하더라도 이번 학기 법에 관련 있는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대학생부터 법을 잘 모르고, 법의 엄중함 자체를 교육받을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의 법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대학생이 스스로 준법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법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당장 이번 학기에도 법에 대한 교양 강의는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법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물론 전공과 관련된 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느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법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종문 (미디어 2): 법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사법기관이 진행하는 대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하자는 의견과, 대학생부터 학교 교육 시스템 내에서 법 관련 교육을 찾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원 (미디어 2): 두 학우 분들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는 임건 학우의 개선 방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끊임없이 개정을 반복하고 있고, 이전까지 알고 있던 법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이 스스로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들의 개정을 정확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어떠한 부분이 바뀌는지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전공과목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도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유민 (미디어 2): 저는 다른 학우분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동의합니다. 다만 대학생이 과연 이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생은 학점, 취직에 있어 엄청난 경쟁을 치르고 있고, 지금도 충분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학생들이 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힘든 대학생들이 오히려 부담을 더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김승환 (미디어 2):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막중한 부담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따로 법에 대해 공부하고 개정하는 것을 일일이 다 파악할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약간은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법에 대해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별로 필수적인 교양으로 법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를 넣고, 전공에는 전공과 관련된 법을 공부하는 강의를 마련하는 등의 시스템적인 서포트가 선결되지 않으면 대학생들이 스스로 법을 공부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나종문 (미디어 2): 네, 저도 학우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스로 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더한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스템적인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에게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대학생의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법을 알리기 위해 사법기관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 교육시스템 안에서 대학생이 스스로 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의견, 일상생활과 전공과목에 있어서 관련된 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 하지만 대학생의 부담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학교 시스템의 서포트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의견들이 한국사회의 준법의식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 열심히 토론에 임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선진화를 이끌기 위한 대학생들의 토론!

최민경 (정경 1):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학우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학우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률 문화를 선진화 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길은 결국 그 국민들이 자신의 탐욕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정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적 조치가 어쩔 수 없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한 나라의 법률 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 자체의 입법과 행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오늘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법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준법 정신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 활발한 토의를 진행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허준 (정경 1): 여느 포럼이나 의회에 참석하면, 참여자들 중 십중팔구 교육을 만병통치약처럼 제시합니다. 물론 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것은 맞습니다.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결방안은 상당히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문제, 경제불황, 기아문제 등 모든 것을 교육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준영 (정경 1): 동의합니다. 이는 접근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법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봉사자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준 (정경 1): 준영학우의 말대로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미디어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 파워가 대두되는 이 시대에 미디어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실제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도가니〉 라는 영화가 도가니법을 제창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인터넷 댓글로 대두되는 여론이 법률 판정을 뒤엎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양한 법들이 유동적이지 않다는 점과 형평성의 문제로 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제를 페이스북 댓글이나 인터넷 기사 댓글 등으로 화만 내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닌, 집단 지성을 이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법들이 어떠한 유폐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여론은 뜨거우나 빨리 식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료를 축적하여 계속 사람들이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의 접근성과 확산성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채연정 (정경 1): 저는 처벌수준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세, 횡령 등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고, 국가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인을 특별사면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법 제도를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벌들은 감옥에서도 VIP 대우를 받습니다. 접견 변호사, 산책, 식사 등 일반 재소자들과는 다른 차별적 대접을 받습니다.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행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교도소에서도 돈이 힘을 가지는 이러한 행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박승연 (정경 1): 이념 대립이 있는 법률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법률의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본권, 더 나아가서 인권의 측면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는 그 경우마다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휴전인 사실을 감안한 징병제가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헌법 19 조의 '양심의 자유'와 39 조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체복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복무 혹은 비무장 군복무 규정이 있는 국가로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준영 (정경 1): 대한민국의 법체계라는 것은 결코 변호사, 검사, 판사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명 '끓는 물' 형식의 대중들의 반응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큰 사건과 범죄가 터진 후에야 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주체성을 갖고 법 제도들에 대해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법제도에 대한 교육이 미비합니다.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라는 사회 과목을 선택해서 듣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지식을 얻을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 시기부터 정부 정책 차원에서 법률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채연정 (정경 1): 또한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며 남에게는 엄격한 법 제도에 대한 존중 문화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비정상회담의 그리스 패널에 따르면, 그리스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준법 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탈세를 하는 것이 일종의 자랑과 당당한 일처럼 되어버린 문화 때문에 세금이 잘 걷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보일 수 있지만, 사소한 의식차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인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민경 (정경 1): 학우 여러분들의 참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는 '대한민국의 법률 문화가 선진화 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대부분의 학우들께서 서로의 의견에 동의해 주셨고, 이번 토론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벌수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누구나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중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며 남에게는 엄격한. 즉, 부족한 법 존중 의식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일상적인 주제가 아닌 만큼 학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참여해주신 학우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강유정(교육 2) :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국은 세월호 사고나 메르스 사태, 불법정치자금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으면서 시민의식, 즉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문화에서는 교통법규의 준수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규정인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과 생각과 이념의 차이에 대한 법률 등의 요소가 있는데, 이들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준법의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갖춰야 할 준법의식을 기르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함께 의견을 나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지회(교육 2) : 우선 이미 있는 준법의식 증진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에 준법의식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단순히 홈페이지에서 제시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연(교육 2) : 정규 교과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특강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지회(교육 2) : 정규 교과로 채택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있지만 모르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그것들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강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김수연(교육 2) : 네 동의합니다. 정규 교과 채택은 비용적인 측면의 문제점도 있고, 현재 사회분위기가 아직 준법의식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특강 정도가 절충안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일회성이 특강이 아닌 지속적인 특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유정(교육 2) : 현재 정규 교과 중에서 그나마 준법의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는 도덕이나 윤리, 사회과목으로는 법과 정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목들조차 준법의식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포함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과목이나 특강으로 추가하는 것도 좋지만, 최근 도덕교육의 정체성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교과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학칙 준수에 대해서도 의견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연우(교육 2) : 주제가 준법의식인 만큼 저는 학칙에 대해서도 의견 나눠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학칙을 통해 준법정신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칙 준수 또한 교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황승우(교육 1) : 그렇습니다. 학칙에 대한 제도는 상벌점제도가 있는데, 상벌점제도의 부작용들이 학생들의 학칙 준수, 준법의식을 더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학생들의 준법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법의식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하는데 상벌점제도는 오히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 학칙 그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연(교육 2) : 방금 의견에 추가를 하자면, 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상벌점제도를 통해 벌점을 주고, 상점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학생들이 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주고, 자발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연우(교육 2) : 교사의 자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사부터 준법의식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잡혀있어야 학생들에게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직 적성검사나 인성검사처럼 준법의식과 관련된 요소들을 판별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법의식 증진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성연(교육 1) :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안에서는 두 줄 서기를 해야 한다, 무단횡단을 해야 한다 등을 가르치지만, 학교를 나오면 지키지 않는 어른들과 사회를 마주하게 되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강유정(교육 2) : 동의합니다. 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인데, 교육과정은 사실상 정책의 형태로 제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교육제도는 그대로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원인들을 교육에만 돌리는 것은 실현성이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사회에서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채, 교육현장에서만 그 답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현장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학교에만 돌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체계, 사회제도와 교육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준법의식을 기르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보았습니다. 총 6 명의 토론자께서는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주셨습니다.

교육현장 내 준법의식 증진의 방안으로는 준법의식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학칙의 준수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지도하는 교사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 준법의식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교육에만 물을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토론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④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공수진(광운대 행정 2) : 지금부터 광운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연구모임에 참가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국은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민 안전 문제부터 불법자금 정치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회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뒷받침하는 제도에 관한 국민호응의 부족과 시민의식의 부재가 이런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법률문화의 선진화는 입법이나 법의 집행, 처벌 등 사회의 여러 분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준법정신은 시민들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한국의 무너진 준법 정신을 바로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이라는 주제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혜림(광운대 행정 2) : 준법정신은 시민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강남역 지하철 사고 때 사람들은 신고보다는 sns 게시를 위한 사진촬영을 하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무단 게시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시민의식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영신(광운대 행정 2) : 준법정신이 떨어진 사례로 최근 캐러비안 몰카 촬영도 있습니다. 뻔히 몰카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단으로 촬영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몰카 촬영 여성은 다른 남성의 사주를 받아 이를 촬영했다고 하는데, 동영상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걸 알면서도 촬영한 것은 기본적인 시민의식마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행해지는 몰카

김혜림(광운대 행정 2) : 저도 조영신 학우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몰카 촬영은 당연히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게시되는 불법 사이트는 광고로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회사들에 대한 처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이트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 광고를 게시하는 회사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사이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조영신(광운대 행정 2) : 공감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람들에게서도 시민의식이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중학교 부탄 가스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일을 벌인 것은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폭발 사건을 저지른 학생은 조승희라는 사람에 대한 존경, 동경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조승희의 총기 난사 사건을 보고 자신도 범죄에 대해 큰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폭발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서 게시한 것입니다. 이는 준법정신을 넘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의영(광운대 행정 2) : 이러한 문제들에 결국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올바른 교육입니다.

김혜림(광운대 행정 2) : 공감합니다. 어릴 때의 바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기 이전에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통 반사회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부모를 보면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부모학교 운영을 활성화시켜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박지혜(광운대 행정 2) : 처벌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김혜림(광운대 행정 2) :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원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나영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영이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은 5 년 뒤, 2020 년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꽤 많이 알려진 큰 사건이었는데 술을 마신 심신 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12 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영국, 미국의 법에 따르면 종신형을 선고받아야 할 중범죄에 한국은 12 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도 처벌이 미약하며 이마저도 잘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뭐해서 봐주고 뭐해서 봐주고 하는 봐주기식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영신(광운대 행정 2) : 그런데 이런 봐주기식 처벌이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기업 총수처럼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봉사라는 처벌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림(광운대 행정 2) :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법률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 장치인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 시간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는 노동법을 잘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버스기사는 2 시간 운전하고 20 분 휴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 효율성이 높아지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노동법을 준수하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 고소가 잘 안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처벌도 미약합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경비원 분신 자살의 경우, 한국에서 만일 명예 훼손에 대한 법률이 잘 정착되어 있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자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신자살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공수진(광운대 행정 2) : 준법정신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도둑을 잡고 징역을 받은 사람에 대한 판결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둑을 잡고 벌을 받은 경우라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김혜림(광운대 행정 2) : 맞습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강화되는 것에는 이슈가 얼마나 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화 되거나 얼마나 뉴스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만큼 처벌이 미약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사건이라도 잘못된 일은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진(광운대 행정 2) : 네, 감사합니다. 광운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한국의 무너진 준법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준법정신의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봐주기식 처벌을 없애는 것, 범법 행위에는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하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정책을 건의하며, 봐주기식 처벌이 일어났을 경우 처벌자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더 큰 처벌을 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⑤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법률문화 선진화를 위해선 반드시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

권혁찬(경제 3)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주제로 열렸던 제 97 차 월례토론회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낮은 준법정신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특유의 갑질문화 역시 문제가 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준법정신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률문화를 선진화시키고 낮은 준법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학우들 간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동현(경제 3) : 저는 한국의 낮은 준법정신은 바로 우리사회의 공권력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경찰의 권한에 관한 설문을 하였습니다. 잠깐 살펴보니 대다수의 시민들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권한이 너무 약하고 시민들이 경찰관에 대한 존경심 역시 약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던 대규모 시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많은 사회적 이슈로 여러 번의 시위가 있었는데 매번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경찰의 버스를 부수는 등 항상 그 끝은 폭력과 혼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양심 혹은 사상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책임감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권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준(경제 3) : 저 역시 이동학 학우와 같은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시위도중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사진이 최근 우리나라에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선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에 대한 존중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역시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은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기 위해선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할 뿐 아니라 그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이동학 학우가 말한 바와 같이 시위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헌법 위에 떼법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선 철저한 법치주의가 요구됩니다.

권혁찬(경제 3) : 공권력에 대한 존중과 철저한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준법정신을 고취하자는 이동학 학우와 이현민 학우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엔 김광훈 학우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경제 3) :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법치주의만을 과도하게 내세우다 보면 사회에는 범법자만 넘쳐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정서가 판결에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준법정신 고취를 위해선 학교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것처럼 학교에서부터 단순히 도덕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나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절대 안된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법치주의를 외치기 보다는 현재 법이 과연 우리사회에 너무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상을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성인중에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과자가 전국민의 1/4 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산에서 도토리 몇 개만 주워도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법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찬(경제 3) : 네. 과도하게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법은 범죄자만 양산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제를 정비하고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김광훈 학우의 의견이었습니다.

함준익(경제 3) : 저는 준법정신 고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유발할 경우에 법이 개입하여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생각한다면 법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동양적인 가치인 역지사지를 항상 염두에두고 자신을 성찰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는 조화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구환필(경제 3) : 저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법을 지키는 당사자들에게 유인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늦은 밤에 신호등을 적색/녹색으로 바꾸어 가면서 켜놓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이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차들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황색등을 깜박이게 켜놓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데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잘 활용할 때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될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권혁찬(경제 3) : 네. 감사합니다. 많은 학우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권력 강화와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준법정신 고취가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적용되는 법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도 중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론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테이저건이나 심지어 총기사용도 허가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게 개선하는 등 공권력의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너무 과도한 기준을 가진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을 위배하거나 초헌법적 법안은 과감히 정비하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⑥ 건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건양대학교 제1차 선진화 연구모임

김다솜 (건양대 국방공무원 2) : 지금부터 건양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국은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나 메르스 사태와 같은 준법정신의 부족으로 인한 많은 사회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건양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비 (건양대 국방공무원 2) : 먼저 우리나라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고지식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무단횡단이나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법규들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준법의식은 시민의식과도 연관이 있고 따라서 이는 시민교육이 중요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이런 시민의식교육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입니다. 특히 주된 교육대상으로서 16-24 세의 청소년들에게 강의 형식은 지양하고 상황극, 토크쇼 등을 통한 양방향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받아 우리나라도 입시교육에만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양방향 교육시스템을 통한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이 형성되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강수연 (건양대 국방공무원 2) : 맞습니다. 특히 시민의식의 형성은 성인이 되기 전 초중고교 시절에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각종 성범죄나 워터파크 몰카 사건 등도 현재 준법정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 교육이 부족하면 못난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준법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한 교육으로 초등학교 같이 어린나이에는 가정에서의 모범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를 예로 든다면 아직 생각이 미숙한 아이들에게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상대방의 대한 배려라는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해주고 중고등학생들은 좀 더 심도 있는 성교육과 함께 법에 어긋난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를 활용해 도가니, 소원같은 영화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주 (건양대 경찰행정 2) :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 발표를 보면 TV 의 여론영향력 점유율은 48.2%로 인터넷 뉴스의 26%와 신문의 17.3%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미디어 중에서도 TV 매체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전 TV 프로 중 '양심냉장고'가 있었는데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을 찾아내어 냉장고를 선물해주는 프로였습니다. 즉 준법정신을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후 6 시에 촬영을 시작해서 새벽 3 시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후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진, 음악, 텍스트를 활용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e 채널처럼 공용채널에서 광고를 활용해 사회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연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소희 (건양대 경찰행정 2) : 한편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따라 배울 수 있는 어른들의 모범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지역 내 최근 5 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건수가 무려 156 건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의 법규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덧붙여 저는 규제에 따른 처벌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린이들도 법을 신뢰하고 법을 지켜야 겠다는 준법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처벌의 강도도 여러번 사고를 내면 누적된 건수 만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시스템적으로도 방지턱을 새로 짓거나 녹색어머니들을 구역마다 체계적으로 세우는 제도를 닦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아이들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김시윤 (건양대 경찰행정 2) : 저도 성인들의 모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인들은 이미 가치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율성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교육보다는 cctv 같은 단속 시스템을 강화하고 벌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연 (건양대 경찰행정 2) : 그렇게 되면 경찰들이 일일이 다 단속하긴 힘드니 시민신고를 활발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신고정신은 준법정신과도 이어집니다. SNS 를 신고제도에 활용하고 신고제도를 간편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처벌과 별개로 벌점을 매겨 몇 점 이상은 공공기관에서 법률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강민주 (건양대 경찰행정 2) :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신고정신을 북돋기 위해 신고에 대한 보상 즉, 인센티브의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정연 (건양대 경찰행정 2) : 저는 다시 청소년들의 준법정신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한국 법교육학회에서 전국 다섯 개 도시의 천 오백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법지식 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임원활동을 한 청소년들이 법지식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교과과정의 법교육 의무화가 중요하고 학생 스스로 법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학생자치법정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옆에서 학생들을 돕는 써포터즈의 역할만 해주는 것입니다.

유현주 (건양대 국방공무원 2) : 학교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현재 지역별로 법질서 바로 세우기라는 목표로 준법정신 실천우수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별로 표창을 해주는 방식인데 어렸을 때부터 법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맥락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을 받은 학교는 국가로부터 교육환경개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함께 학교 생활규정을 만드는 학교도 있고, 욕설 없는 학교만들기, 친구사랑 주간을 정해서 활동하는 등 준법정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강수연 (건양대 국방공무원 2) : 네. 저 역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사과데이라는 날이 있었는데, 이 날은 사과하고 싶은 친구에 편지를 써서 선생님께 전달하면 선생님께서 사과파이와 함께 그 친구에게 배달해주곤 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의 사이가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시윤 (건양대 경찰행정 2) : 하지만 실제로 모범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만 참여하거나 보여주기식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강수연 (건양대 국방공무원 2) : 물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옆에서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면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부터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준법정신을 지키려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역시 근본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김다솜 (건양대 국방공무원 2) :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 시스템에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개개인의 마음자세라는 것에 동감합니다. 덧붙여서 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교육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준법정신은 글로벌화되는 현재 나라의 위상이나 품격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새로운 관점에서 해외로 나가는 성인들 중 어학연수나 비즈니스로 오래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국내에서 공공기관을 통해 그 나라의 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건양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법률교육에 대한 토론을 나눠보았습니다. 총 8 명의 토론자께서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에서는 청소년 시기의 준법정신 형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는데요, 선진국인 독일을 본받아 양방향 교육을 도입하고 교과과정의 법교육 의무화와 학생자치법정 같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시민들에게는 법 교육과 더불어 처벌의 엄격성과 실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동시에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디어를 활용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연한 방법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열의를 갖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⑦ 한성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박상희(한성대 무역 3):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법 준수 및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아직 많은데요. 따라서 법 준수 및 질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민의식과 개개인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법률시스템이 올바르게 뒷받침되고 확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주제로 한국 헌법인 '법률에 의한 행정'의 실질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권과 경제적 자유의 공공성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시스템의 문제 및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승(건국대 경영 3): 먼저 저는 우리나라 법의 집행이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 및 처벌이 많기 때문에 법의 권위가 떨어진 데에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성범죄와 관련하여 형량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2010 년 미국에서 11 살 소녀를 성폭행한 범인에게는 징역 99 년을 선고했는데, 2008 년 대한민국에서 8 살 소녀를 성폭행한 조두순사건은 징역 12 년을 선고하여 5 년 후인 2020 년에 가해자는 출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량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술을 먹고 사건을 저질르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술을 먹으면 형량이 감형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국민의 정서와 떨어진 법의 집행은 법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을 떨어뜨리고 권위가 실추하게 되며 결국, 법의 준수 및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다은(한세대 광홍 4): 저도 앞선 학우의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보다 강력한 처벌 및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형량에 관한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나 최근 모 국회의원의 사위가 결혼 전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법원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 년~9 년 6 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이탈해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기본원칙을 국민 모두가 의심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안종태(경희대 무역 2): 저는 단순히 법에 대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사후,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 및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이성적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일이므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 폭행에 시달린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 관리 및 지원을 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신재우(한양대 신공 2): 저는 앞선 학우의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법 집행은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저는 더불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그와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나 리어카가 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인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충격가하여 경미한 부상을 입힐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조항 제 9 호에 해당돼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나 리어카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운전자 등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폐지를 줍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음에도, 가해 차량으로 지정되는 경우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 가구당 자동차를 2 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대부분이며 엄청난 자동차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기존의 도로교통법 조항의 자전거와 우마차 등을 차로 분류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법조항이고 법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민(고려대 사학 2): 저는 앞선 학우의 사후적 시스템의 보완에 못지 않게 사전적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전적 불법 행위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행위는 너무 광범위하여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많으며 자본주의 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완전히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명학히 규정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몰래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고, 몰래카메라를 촬영·유포한 자의 경우 그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정예슬(숭실대 경영 3): 단순한 범죄, 살인, 강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불법적 투기시장 및 내부정보로 인한 투기 및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적 투기 시장, 내부정보로 인한 투기와 조작이 많고 절도, 강도보다 약한 죄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집 마련의 기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조직적 투기세력들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려 과다중복 청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법 위장 전입을 통해서 중복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분양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불법적 투기와 조작은 우리 다수의 삶과 밀접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봉주영(중앙대 경영 3): 앞서 말한 학우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이와 같은 사례는 내부정보로 인한 비자금 조성, 투기, 조작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법을 만들어야 하며 법도 공시주의하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일어난 경남기업 구조조정 사태에도 공시없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다가 겉잡을 수 없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한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거대한 자본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시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33 년 증권법, 34 년 증권거래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브랜디스 판사가 감시, 투명성을 강조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법치주의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본시장에도 거래, 투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확한 정보생산 및 공시를 우선시하여 투기시장 및 내부정보로 인한 투기 및 조작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상희(한성대 무역 3): 그렇다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시스템의 방향뿐만 아니라 개인 및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류민정(성균관대 글경 2): 제 생각에는 아무리 시스템이 변화하고 개선해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법은 없어서는 안되며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중, 고등학교는 법과 사회라는 과목(지금도 같은 이름일 지는 모르겠지만)을 통해 배울 수 있겠고요. 자율적인 성인인 대학생 때 오히려 법에 대한 과목을 필수 교양으로 만들어 배우게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지어야 할 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이혼에 관한 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웃음)

박세윤(서울대 국문 1): 저는 권력이 법보다 우선시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체제는 당이 이끌고 국민이 주인이 되며 법에 의거한 통치입니다. 즉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아닌 단순히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장치로 입법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암묵적인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정부패입니다. 공천이나 선거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다면 그것은 위법으로 법을 무시하고 권력 유지를 위한 개인적 이득 취하기에 불가할 뿐이죠. 바로 이것이 권력이 법보다 우선시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박상희(한성대 무역 3): 네, 다들 다양한 예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시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며 유전무죄 무전 유죄의 법 집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불법을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법 질서 및 준수를 위해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확립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를 이끌 우리세대가 보완하고 정책을 건의하여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 선진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쁘신 와중에 열심히 토론에 임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⑧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송지나(동아대 경영 3) : 안녕하십니까. 제 1 차 울산지역학생들의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때 자가격리가 된 사람이 골프장에 가거나 목욕탕에 가는 등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무시한 채 규칙과 약속을 어기는 낮은 준법정신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낮은 준법정신에는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 혹은 편의주의적 법치의식등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생각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와 경찰 등 공권력 행사 주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연(계명대 통계 4) : 준법정신과 관련하여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교통법규위반단속을 강행하였고, 처칠은 "오늘 총리인 내가 두 번이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우리 장한 두 경찰에게 책망과 교훈을 받는구나" 라며 뿌듯해 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해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총리나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경찰 등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요? 준법정신을 지키는 것이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나보다 높은 사람 혹은 나보다 잘사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봐주겠지라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제도 혹은 인식개선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사람들에게 준법정신향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효과없을 것 같습니다.

정예민(대구대 건강증진 3) : 저도 최소연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뉴스를 보면 재벌의 탈세, 각종 회사법 위반 등 다양한 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에서도 이와 관련한 주제를 여러 번 다루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터트린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경찰과 검찰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사람들에게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겠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은 재벌, 고위공무원들은 법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 주겠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타파해야만이 우리사회의 준법정신이 개선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를 위해 이따금씩 뉴스에 나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예리한 판단과 판결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각 수사기관들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쌓여 각각의 판례로써 그 다음 재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람(울과대 유교 1) : 저도 그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단지 수사기관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법의 집행과정에서 공명정대한 판결과 판단이 내려지려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수사기관에는 정의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의 불양심적인 행동 때문에 그것이 가려지는 것이죠. 이분들의 노력이 나라 전체로 확산되어 국민전체의 준법정신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국민들의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너네도 안지키니까 나도 안지켜'가 아니라 '나는 지킬테니 너도 지켜주길 바란다'는 식의 의식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이승현(울과대 간호 4) : 공권력과 국민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혹은 좀 더 먼저 준법정신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하는가는 따질 의미가 없다고 봐요. 둘 다 노력해야 합니다. 공권력을 구성하는 사람 또한 국민이며 그 공권력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니까요. 국민은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게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다만 이 과정에서 공권력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 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고위층의 범법행위에 대한 재판, 예를 들면 땅콩회항이나 각종 재벌 탈세, 비자금 조성혐의 등등에서 정말 국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권력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공권력의 쇄신을 위해서는 경직된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예민(대구대 건강증진 3) : 국민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부분 또한 깊이 동감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공권력 스스로의 쇄신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대에 뒤처지는 의식이나, 규칙 등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나오듯 상사가 지시를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입니다. 소신수사인가 하극상인가에 대한 논란 때문에 2004 년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검찰총장은 2013 년 11 월 13 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며 "어떤 조직이던 상하관계가 없으면 조직이 성립할 수 없다, 그 조직이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 만큼 원칙이 완전히 폐지된 것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이 원칙에는 물론 장단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융통성이란 것이 존재하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위의 인사청문회가 열린지 1 년 후 유병언 사건과 관련해 33 년전의 지침이 아직까지 유지된다거나, 검찰 내외부 소통이 원활하기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검찰의 보고 및 수사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수사 및 판결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마련되어야만이 좀더 공명정대한 법치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람(울과대 유교 1) : 저는 법치의식의 성장을 위해서는 법 집행이 더 단호하고 철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준법정신과 관련하여 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네요. 준법정신이란 큰 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민들 대부분 우리나라의 규칙을 어겨본 경험은 있을 겁니다. 무단횡단, 새치기등 사소한 것들부터 자영업자분들의 매출 누락 등 주변에서 이런 범법행위들은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굵직한 사건들도 사람들로 하여금 허탈하게 만들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행위들도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매출을 어느 정도 누락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데 나만 매출을 정당하게 신고하면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공권력 주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더 단속을 강화하여 아주 단호한 법의 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연(계명대 통계 1) : 시민들의 의식성장에 공권력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이야긴가요?

이보람(울과대 유교 1) : 그렇습니다. 강압적이고 지나친 개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소한 범법행위도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는 데에는 법의 단호한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법만 있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체계적인 법 교육이 필요하다.

최소연(계명대 통계 1) : 네 저도 법의 집행이 분명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 의식의 개선을 기대하기엔 너무 단기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느리고 쉽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성 자체가 준법정신이 투철하게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역시 공공기관들의 노력은 중요합니다. 학교등 교육기관에서 시험을 위한 이론 공부가 아니라 이러한 법이 왜 생겨났는지, 법을 어겼을 시에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 오는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일깨워주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승현(울과대 간호 4) : 국민 전체의 의식 성장으로 인해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들만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법률봉사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져 온 국민이 법 집행의 선의의 감시자가 된다면 수사기관들도 자연스레 좀더 투명해지고 그럼 그 영향이 국민들에게로 돌아가 준법정신이 향상되는 선순환이 될 수 있겠군요.

송지나(동아대 경영 3) : 결국 공권력 주체들은 스스로의 개선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의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범위 내 융통성을 가지고 소신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벌, 고위공무원 등 소위 '높으신 분'들의 판결 또한 일반 국민들과 다름없이 공명정대하게 내려지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단기적으로는 법의 단호한 집행, 장기적으로는 교육기관에서의 깊이 있는 법 교육으로 나라 전체의 법치의식이 성장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선의의 감시자로서 준법정신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1 차 울산지역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와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⑨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한림대학교에서 제 1차 선진화 연구모임이 열렸다.

용지수(한림대 언론 3) : 지금부터 한림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의 세월호 참사와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불안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질서와 준법의식을 강화해 사회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나 메르스 관련 사태들은 모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안전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사회와 나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소한 규정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지켜야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엄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법률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법률문화의 기본을 세울 지와 더불어 더 나아가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통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선진화된 법률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규율하는 법률을 잘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상을 얼마나 잘 반영한 것인지, 너무 앞서거나 뒤떨어진 가치를 반영한 것은 아닌지, 또 대다수 국민들의 가치나 보편적인 정서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고찰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 제정에 있어서 국민 투표 제도를 적극 도입하거나, 미디어를 활용해 입법, 법 개정 과정을 공개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산다면 가능합니다. 국회는 국회방송이라는 전용 채널을 두어 입법과정을 공개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방송의 대다수 프로그램은 입법, 법 개정 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의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이에 국민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간단한 생각을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다른 학우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주하(한림 언론 3) : 저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식과 합리성에 토대를 둔 것인 만큼 대부분의 경우 국민들은 무엇이 정의이고,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 지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법이고 정의인가를 밝히는 노력보다는, 이미 알려진 법과 정의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범법자의 경우 지속적이고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 몰라서' 또는 '어쩌다 실수로' 법을 어기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법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해야 합니다. 조금은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국민 전반에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김진휘(한림 언론 3) : 이주하 학우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선진적인 외국에서 이미 이러한 예들은 많이 볼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의 경우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상당수의 선진국과 외국에서는 성폭력 범을 종신형, 교수형, 사형, 화학적 거세 등의 엄벌로 다스리고 있으며, 성폭력을 가장 추악한 범죄로 여겨, 교도소 내의 다른 죄수들조차도 성폭력범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부의 판결에서는 일부를 '늦은 시간에 밖에 돌아다녔다' 거나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부분이 징역 10 년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8 살인 나영(가명)양을 가혹하게 성폭력 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조두순의 경우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처벌을 받고 5 년 뒤 출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을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점이며, 이를 개선했을 때 우리나라 법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인식이 국민전반에 퍼져, 범죄 발생률, 더 나아가 재발률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종현(한림 언론 3) :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에 있어 보다 철저한 법규 준수 의식이 확보될 필요가 있지만, 특히 집회, 시위와 관련해 원칙에 따른 철저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인 목적의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는 '법이 정당할 때는 지키지만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의 편의주의적 법치의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희 목격하는 바와 같이 집회, 시위 시에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공개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법률을 어긴 행위는 가혹한 처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집회, 시위와 같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의 경우 원칙에 따른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준법의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지수(한림대 언론 3) :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법집행을 얼마나 엄격히 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 범죄의 발생률과 재발률을 낮출지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조금 포커스를 바꿔,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통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진휘(한림대 언론 3) : 저는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제도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종신법관제이고 영국이나 홍콩은 법관으로 임명되면 추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개업하고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과도한 영리를 취하는 모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전관예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현(한림대 언론 3) : 김진휘 학우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전관예우 때문에 불합리한 법집행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도가니〉라는 영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실제 사건에서 청각 장애우, 지적 장애우 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농아 학교의 교장, 교감 등 가해자들은 전관예우가 적용되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관예우라는 제도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법관으로 임명된 후엔 추후 변호사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야합니다.

이주하(한림대 언론 3) : 앞선 두 학우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하고자 자료 조사를 하던 중 해외의 '법률의 후견적, 치유적 역할'의 사례라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법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후견, 치유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사건의 경우 '가정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의 삶에 대한 준비, 경제적 지원이나 치유적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정법원은 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해결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는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환자로 보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병리현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병원의 역할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지수(한림대 언론 3) :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사회를 규율하는 법률을 잘 만드는 작업과 대다수 국민들의 가치나 보편적인 정서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고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저의 의견에 이어, 범법자의 경우 지속적이고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이주하 학우의 의견, 특히 성폭력 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김진휘 학우의 의견, 집회, 시위와 관련해 원칙에 따른 철저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원종현 학우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더불어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통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김진휘, 원종현 학우의 의견, 법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후견, 치유적 프로그램이 마련 돼야 한다는 이주하 학우의 의견이 발의됐습니다. 여러분의 이 의견들은 차후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⑩ 용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장대혁 (용인대 물류통계정보 2): 지금부터 서울-경기지역 대학생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은 법률문화의 선진화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법의 강한 엄격성 (처벌정도/법의 집행력)으로 시민들의 법률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각자의 소견을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강하게 해야 할까요?

최아영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3): 저는 법률의식을 높이려면 법 자체의 처벌 강도를 높여서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심판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이 안정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솜방망이 처벌은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법의 범위는 법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위법에 대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허송주 (아주대 심리학과 3) : 저는 처벌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법망을 유지하는 이들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작용해야 하며 법률의식의 선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현재의 법 시스템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처벌이 있어도 시민들의 법률의식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송해용 (아주대 경영학과 3): 허송주 양의 의견에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법은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입니다. 법이 바뀐다고 해서 법률의식의 선진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중이 공유하는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법을 제외하는 요소들도 함께 적용하는 범위에서야 비로소 법률의식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가 범죄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통계를 한 번 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를 생각하면 오히려 제일 강도 높은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범죄가 횡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훈 (한양대 경영학과 4):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처벌의 수위가 아닌, 집행과정을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을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엔 대한 처벌은 이미 다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미 있는 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규제하는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인력을 충원하고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법에 대해 처벌의 수위를 건드리는 건 여러 모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 전체가 불편해져서는 안됩니다.

조서경 (성균관대 경영학과 4) : 저는 논제로 돌아와서 법집행이 엄격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애기하고 싶습니다. 싱가포르는 교통질서, 청소, 상점, 시장 등 생활전반의 모든 부분에 규제가 엄격하게 집행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엄격한 법규가 시민들의 높은 준법정신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이민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부정적인 면모도 존재합니다. 태형의 경우 1.2M 회초리로 무술유단자인 집행관이 맨 엉덩이를 때리는 건데, 최소 3 대에서 최대 24 대 까지라고 합니다. 강도, 유괴,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는 물론 불법이민자까지 이 태형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한 해 6 천 건의 선고가 내려지는데 한 번 선고된 것은 꼭 이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형은 처벌의 강도가 높은 법으로서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춘다는 측면이 있지만 복종적이고 편협적인 시민의식을 조장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법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태형을 도입하지는 않겠지만, 강한 법규제의 부작용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지연 (한국외대 스페인어학과 4) : 동의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법의 엄격함이 커지고 기초질서를 위한 규제가 늘어나게 되면, 법규제로 인한 개인의 불편함이 조금씩 커지게 될 것입니다. 즉, 개인의 합인 전체의 불편함도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질서'라는 것의 기준이 점점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선진국 위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서로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법이라면 꼭 선진국의 기준에 맞춰 엄격한 잣대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개인들이 원한다면 몰라도, 대다수의 개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더 크다면 그 높은 기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대혁 (용인대 물류통계정보 2): 네, 법률의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법률의식 선진화 그 중에서도 법 집행의 엄격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봤는데요. 법의 엄격함이 법률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셨습니다. 또한, 엄격함보다는 기존의 법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으로 우리가 법의 집행에 있어서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청년위원회와 같은 시민 재판소, 입법부 등을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을 모셔와 법에 대해 항상 논의해보고 그 엄격함과 집행 과정, 어떤 결정이 옳은지를 함께 고심해보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령과 직군의 사람들이 함께해 고민한다면 법에 대해 좀 더 좋은 의견일 나올 것이고 이 현상은 우리의 법률의식뿐만 아닌 시민의식까지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오늘과 같은 좋은 토론이 있고 우리 선진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⑪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조준상 (경영 3):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국은 시민들의 부족한 준법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수의 시민들이 법과 질서를 자발적으로 지키면 이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으로 요령과 편법을 통해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서울시립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현재 이러한 우리나라의 낮은 준법의식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개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엄중한 처벌과 학교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경각심을 증가시켜야 한다.

정범규 (경영 2): 우선, 저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준법인식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법의 권위가 실추된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법을 어겼을 때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을 요령을 통해 피하면 이익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의 탈세나 횡령 등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준이 매우 부족합니다. 회계장부의 조작을 통해 기업의 돈을 횡령한 기업인에 대해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몇 년에 불과한 징역이 부과되거나 이 또한 국가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어겼을 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유인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김유진 (경영 3): 저는 학교 교육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는 개인이 별도로 사법고시를 준비하거나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서는 대부분 법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경영학부 학생들의 경우도 기업법이라는 전공과목 외에는 법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할 기회가 흔하지 않죠. 이 때문에, 우리 대부분이 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친숙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준법의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법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나 관련 실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준법의식에 대한 경각심 증가로 이어져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중한 접근을 통한 법률 재개정 또한 필요하다.

조준상 (경영 3): 법을 어겼을 시 처벌에 대한 강화와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의 법 관련 교육, 실습을 통해 준법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훈 (경영 3): 저 역시 두 학우 분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개선 방안들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 자체의 지속적인 재개정을 통한 발전인데요. 여러분들도 법이라는 것이 개정 당시로부터 상황이 변함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또한, 여야 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제때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문제 상황에 한 몫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개선되어, 현재의 상황과 괴리가 있는 법안들이 지속적인 재개정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 적합하게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 자체가 이치에 맞아야지만, 국민들이 이에 자발적인 수긍을 할 것이고, 준법의식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수 (경영 3): 저도 문제가 있는 법률의 재개정에 대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국가를 지탱하는 법률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게 된다면, 그것의 위엄이라든지 영향력과 같은 것들이 감소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드는데요.

법률의 재개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왔다갔다 식의 일관성 없는 수정이 아니라 반드시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국민들이 불필요한 의구심 없이 법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유진 (경영 3):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일부 법안에 대해 공감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다시 뒤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때마다 법을 바로 개정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 물론, 신중하게 고려한 이후에 법률 재개정을 하기로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조준상 (경영 3): 네, 저도 학우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안에 대한 일관성 없는 재개정과 문제 법안에 대한 무기한적인 방치 사이에서 신중한 고려를 통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중간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시립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낮은 준법의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았습니다. 학우 분들 모두가 현재 우리나라 준법의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종합했을 때, 준법의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 위법에 대한 유인을 줄임과 동시에, 학교 교육에서 법 관련 교육 및 실습 증대시켜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과 큰 괴리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하되, 일관성 없는 왔다갔다 식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한 접근을 통한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재개정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국회에서의 계류 없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준법의식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⑫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최현수(예술 3):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홍익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여러가지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법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고, 결국 이러한 토론문화의 정착이 법률문화의 선진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토론문화의 발전을 통하여 법률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고, 교류한다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좀 더 발전된 법률문화의 정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연구모임은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토론하는 문화의 정착이 중요한데, 토론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효창(예술 4): 저도 토론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의사결정을 하곤 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토론문화는 좀 더 사회적으로 발전된 결과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토론 수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교육이 필요합니다.

윤대일(예술 3): 저도 성효창학우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위주의 교육들로 인하여 내 의견을 남들과 교환, 교류하는 일이 매우 적어지고 문제풀이식의 주입식 교육이 강조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고등학교때 독서토론동아리활동을 했었는데요, 쉬운 책부터 어려운책까지 다양한 책들을 읽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같은 책인데도 여러 의견과 해석이 나오고, 그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 현장에서 토론 수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면 좀 더 토론문화가 익숙해지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송화(예술 4): 교육 현장에서 토론 수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토론 교육은 대학교에 와서 진행하여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법률문화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토론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법에 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구조적 차원에서 만든다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백세은(예술 4): 저도 이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인들의 측면에서는 토론교육이 중요한 것 같고, 구조적으로는 법률문화에 대한 다양한 토론 기회가 있다면 법에 대한 토론문화가 좀 더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좀 더 나아가서 토론문화가 꼭 오프라인에서만 진행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온라인 소통이 증가되고 발전되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예술 4): 온라인 소통은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의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너무 가벼운 의견이나 욕설, 비방 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윤대일(예술 3): 저도 그런 부분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지속적 토론이나 의견 교류보다는 일회적 의견제시나 지나치게 가벼운 의견들이 난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세은(예술 4): 물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제를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좀 더 공개하고 떳떳하게 교류한다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토론 문화를 통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잘 이용하면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현수(예술 3): 학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윤대일 학우의 토론 교육 강화는 우리나라 청소년, 학생들의 생각을 좀 더 많이 발전시키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률문화의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든다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토론 문화나 창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잘 이용한다면 새로운 토론의 장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세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다양하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에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진화 과제 16: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I)

- 정치, 사회 편 –

(제 88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김초아(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공황상태의 야당, 무능력한 여당은 '식물국회'를 초래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는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한국은 현재 혼돈의 상태인데요, 이에 9 월 25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월례토론회에서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치,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한국사회가 헝그리(hungry)에서 앵그리(angry)사회로 변했다고 지적하며 공화주의적 애국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토론자로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수명을 다한 공공 시스템과 정치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상래 국민통합운동 상임운영위원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했고 이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무엇보다도 편파, 왜곡적인 보도로 선동을 했던 언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갑제 대표는 반민주적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를 해결할 '진실, 정의, 자유'에 기초한 새로운 우파 정당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네 분의 다양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는 특히 조갑제 대표님이 지적하신 야당의 문제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야당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선거에서의 참패와, 민심을 잃어가는 야당

세월호특별법 논란 등에 따른 '정부 심판론'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6 월 지방선거와 7 월 재보선은 야당의 패배로 끝이 났고, 제 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10% 대로 떨어지는 등 민심은 제대로된 리더없이 아직도 지리멸렬(支離滅裂) 상태인 야당에 점차 신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야당 내부에 있습니다. 국익을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 없이'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외치는 정당을 과연 어느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야당이 구시대적 정치를 답습하고, 계파 문제 등으로 인해 내부적 분열 상태가 지속된다면 잃어버린 민심은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목적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는 야당의 문제는 출범 5 개월이 되도록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식물 국회'를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야당만의 문제일까요? 법안 통과는 둘째치고 여야 간 소통도 어려운 무능한 국회를 초래한 것은 여당의 책임도 큽니다. 바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데요,

국회선진화법은 2012 년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이른바 '날치기')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 5 분의 3 의 동의가 없으면 모든 법안이 국회에 계류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즉, 야당의 동의가 없다면 여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야당의 붕괴와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국회는 마비되었고, 국회선진화법은 오히려 여당 스스로의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꼴이 된 것입니다. 5 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한 건 통과시키지 못했던 식물국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여론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국회선진화법 폐지로 국회의 정상화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한국 정치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한국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 정상화를 통한 정치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국정도 멈춰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앞서 언급한 '국회선진화법'입니다. 물론 좀 더 성숙하고 민주적인 선진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고자 했던 취지나, 자체의 의미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은 어떤가요.

여야가 건전한 경쟁이 아닌 정권 획득을 위해 서로를 헐뜯고 반대하는 미숙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 상황으로 볼 때, '국회선진화법'은 시기상조(時機尙早)이지 않을까요? 따라서 국회의 정상화와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 해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화된 정치를 위한 여야 정치인들의 노력입니다. '폭력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던 이유에서처럼, 정치적 갈등은 여야 간 대화, 합의를 통한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위기의 한국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전한 정치'가 바로 서서 현 위기를 타개하는 데 선두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름만 '선진화'가 아닌,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고 여야가 함께 화합하고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② 김태준(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오늘날 대학생, 청년층의 더욱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요구됩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편으로는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필자 역시 무엇이 위기인가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9 월 25 일 있었던 '벼랑끝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월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언론의 문제 등 많은 점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공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님은 '우리나라에 공공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인구 감소 문제 등 사회 전반에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신호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계속 남아 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공공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지방자치 시스템이나, 사법, 고용, 노동, 교육, 국방, 안전 등 많은 부분을 포괄합니다. 이들 시스템은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며 위기 시에는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할 공공 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성장,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고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따라 실업자,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3 포(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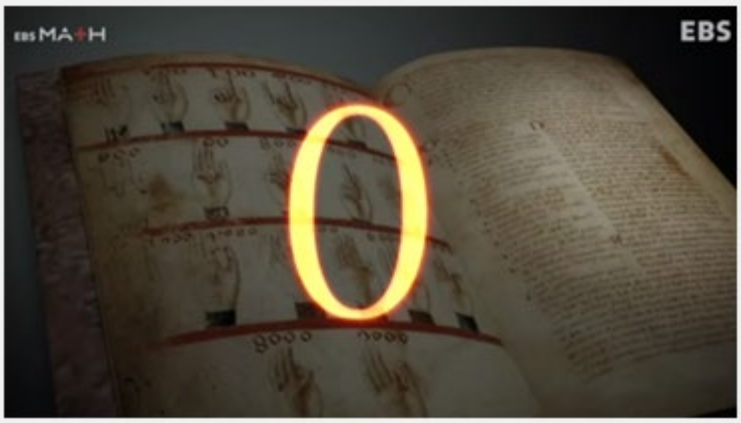
대학생들은 졸업 이후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전문직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상류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그 만큼 우리나라의 공공 시스템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업이나 중소기업 취업 등의 도전을 하고 싶어도 실패를 하게 될 경우의 대가가 크다는 점, 구제책이 부족하다는 점은 우리나라 청년층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선택만을 강요하게 만듭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공공시스템의 부족, 특히 청년층을 위한 공공시스템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특히 정치부분에서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기득권자들이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을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에 저는 청년과 대학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 노인부양 문제 등 공공 시스템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피해자는 대부분 오늘날의 청년층, 대학생들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이나 법안 상정에 있어서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이 정치영역이나 정책수립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청년과 대학생의 정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영역과 과정에 청년층, 대학생들의 참여를 막는 오늘날의 상황도 문제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중 20대는 단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 19 대 국회의원 중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 30 대는 당시 39 세였던 김세연 의원만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는 단 6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 대 국회의원은 지역구, 비례대표 통틀어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청년층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청회나 선거에도 주도적인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권들이 청년층을 인식할 것이고 청년층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청년층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 청년후보 할당제'를 제안합니다. 현재 각 정당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층을 위한 정책, 청년층을 위한 공공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치영역으로 청년, 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통한 청년 정치인재 등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청년층의 목소리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청년만을 위한 정당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의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한다면 우리나라의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결하는 동시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시스템의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1.http://www.youtube.com/watch?v=BEQsxlW8nPU
2.http://www.youtube.com/watch?v=ZkzEGQEQ444
3. http://www.youtube.com/watch?v=LctHM9l8ci4

③ 김현성(이화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은 역병처럼 번져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더라도, 참사 초기에는 유족과 슬픔을 같이 하며 안전한 국가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극심한 이념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단합시켰던 참사가 한국을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분열은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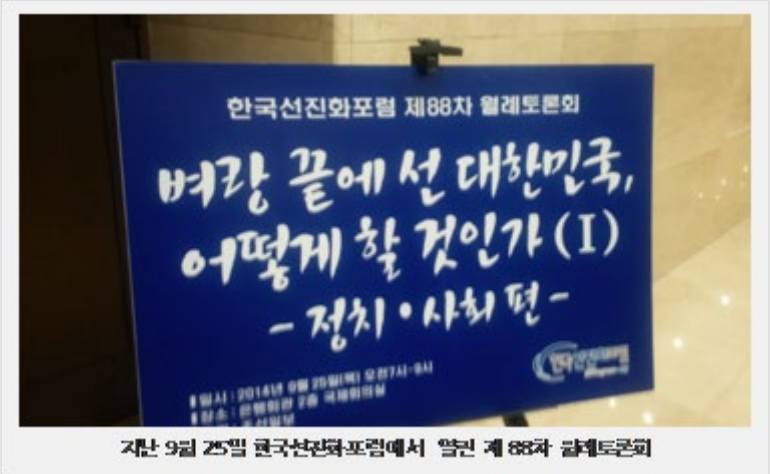
이에 25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월례토론회에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의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가 '헝그리 사회'에서 유례 없는 '앵그리 사회'로 변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온라인 공간속에서 나타나는 증오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는 사회로 쉽게 전이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주제발표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정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제 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민주주의조차 보장하지 않고, 종북 성향 세력과 공조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가의 정체성,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의지와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 이상래 국민통합운동 상임운영위원은 우리 사회가 가지는 문제점으로 언론의 선동과 과잉민주화를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으로서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토론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원흉은 다름 아닌 수명을 다한 공공 시스템"이라 지적하며, 정치시스템의 기능부전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7 공화국을 건설하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9월 25일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열린 제 88차 월례토론회

저는 공공시스템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논해보고 싶습니다. 김대호 소장님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공공시스템, 즉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먼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즉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며, 공공교육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성의 전당인 대학의 교육시스템 변화가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그 나라 사회의 질적 수준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대학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인재를 키워내는지는 사회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교육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나라 대학들은 급격한 성장기 속에서 산업 인력을 배출하는 통로역할을 하였기에 취업과 스펙 같은 학생 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남과 나눌 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 사회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가진 인재를 기르는 쪽으로 대학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로 미국 하버드대는 '나눔과 봉사를 강조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갈등없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성숙함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나눔'을 중시하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학생이 주로 다니는 출입구인 덱스터 게이트(Dexter Gate)에는 두 개의 문구가 쓰여 져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enter to grow in wisdom', 나갈 때는 'depart to serve better the country and kind' . 대학에 와서는 지혜를 배우고 졸업한 뒤에는 더 나은 세상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하버드대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하버드대 출신인 빌 게이츠가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대학 시절 나눔에 관대한 학교 시스템 아래 청년 시절을 보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국내 대학들도 하버드대 교육과 같은 시스템으로 바꿔어야 합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지식 전달과 스펙 쌓기에만 열중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체계화 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많은 성숙한 시민들로, 현재 극심한 분열을 이겨내고 점차적으로 단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④ 류호영(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흔들흔들, 대한민국 정치 · 사회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거진 정치적 이슈들은 불안하게 서있던 대한민국 정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정치권은 대립과 분열을 막고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당리당략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듯 합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이 9 월 25 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정치, 사회 분야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계급투쟁적 가치관을 지닌 세력이 反국가적, 反헌법적 행태를 보이면서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동적 노선에 집착하고 있다.”는 야당에 대한 우려와 여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자유통일정당' 출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막무가내식 불복종, 방종과 반항이 민주주의라 착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좌편향 역사 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공화주의적 애국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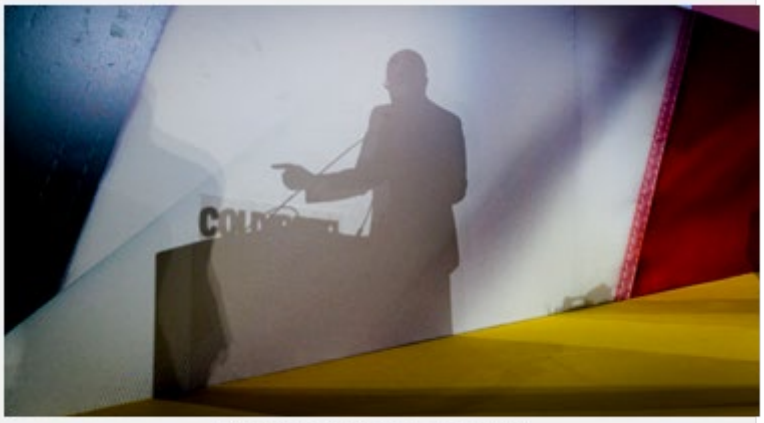
국가정치의 두 기둥: 야당과 여당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뒷받침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야당과 여당입니다.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구조를 만들고 운용하는 이 두 주체에 대한 문제해결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야당의 문제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야당은 장외(場外)투쟁을 통하여 종북성향의 좌파 세력과 공조하곤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핵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비호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사일방어망을 건설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등의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북한에는 유리한 입장을 취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를 비호하는 등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국가적 야당은 한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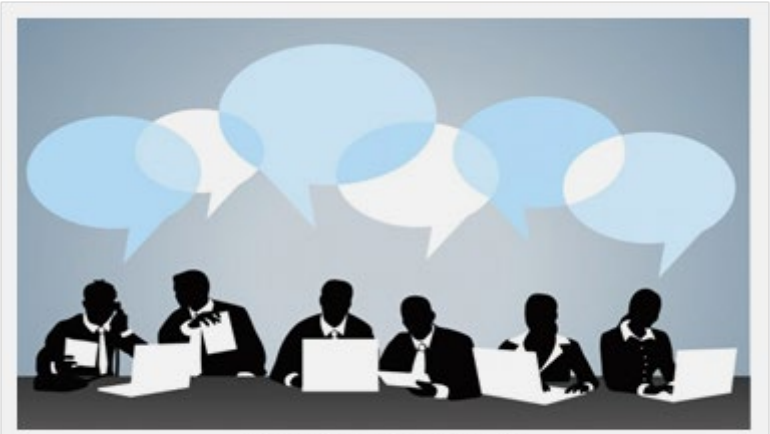
야당은 여당으로 고친다!

저는 그 문제를 이념적 확신이 있는 여당의 존재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당은 헌법에 대한 충성심과 반공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약합니다. 국민의 지지와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종북좌파의 전략과 본질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여 야당의 선동과 억지에 끌려 다닙니다.

여당은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체제를 유지하고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헌법정신과 애국심으로 무장한 이념결사체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사교단체처럼 행동하고 웰빙 기회주의적 행태를 띱니다.

어떤 이는 보수정당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으니, 보수층이 있어도 보수정당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보수층의 불만에 대해선 “우리가 싫다고 좌파를 찍을 거냐”라는 식으로 나오니 지지층과 정당 간에 동지적 유대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히 야당의 문제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조금씩 바꾸어가자는 차원에서 소박한 제안을 한 가지 해보고자 합니다.



공중파 TV 속 여야토론

공중파에 방송되는 “여야토론” 어떠신가요? 여당 . 야당 의원들이 토론장 스튜디오에서 만나 특정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갑론을박하는 자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는 것이지요. 토론 참석을 반드시 국회의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국가는 토론방송 제작에 재정적 도움을 줍니다.

잘 보지 않는 국회방송 보다는 KBS 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을 TV 방송으로 내보내고, 주요 언론사에 기사를 게재합니다. 토론을 준비하는 와중에 의원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됨과 동시에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신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대권주자들끼리 나와서 방송으로 토론하곤 합니다. 이를 보면 그들이 가진 정치적 신념과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치적 주제에 어려워하거나 지루해 할 수도 있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시청할 것이고, 시청률이 낮더라도 바른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론을 참여하는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모두에게 정치적 견해를 설파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스스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시청하는 다른 의원들과 하나의 자극제로서 다가올 것이며, 배움의 스승이 되거나 반대이론을 발전시키는 경쟁자가 되어 국회의원 전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과 의원들에게 ①애국심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고, ②반(反)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주고, ③종북세력과 선동세력 저지하며, ④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와 게으름을 타파하고, ⑤지지층 국민과 동지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성장과 선진 민주주의로의 발돋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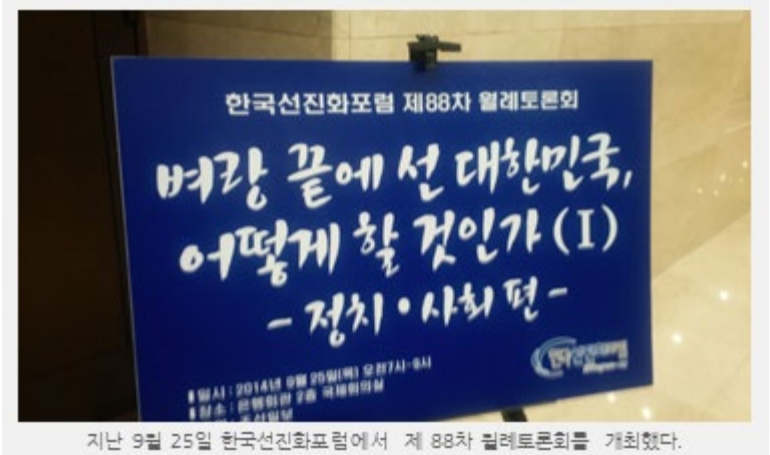
더욱 좋은 것은, 마찬가지로 국민도 이 여야토론을 시청하면서 정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동과 거짓언론에 흔들리지 않는 깨어있는 선진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때에서야 비로소 주인의 자리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고로 정치인들의 올바른 행보를 이끌어준다면 정치의 선진화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와 문화, 그리고 사회는 더더욱 선진화될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아무리 완벽히 짜임새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제도에서 벗어나거나 제도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지요. 자본주의도 인간의 욕심이 없었으면 공유자원의 비극 따위는 일어나지도 않는 허점 없는 경제논리입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대로만 하면 최고의 정치제도이지요. 하지만 그 내부를 구성하는 인간의 수준에 따라 저질이 될 수도 고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과 잠재력은 최고급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⑤ 박성찬(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지난 9월 25일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제 88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마비된 국회, 신뢰를 잃은 정부, 투쟁으로 점철된 여론, 수명을 다한 공공 시스템. 대한민국은 대성장의 시기를 지나 바야흐로 대혼란의 시기에 국면했다. 게다가 주위 강대국들은 미친 듯 달려가는 마당에 우리는 한가운데에 서서 서로 싸우고들 있으니 다소 과장된 말로 벼랑 끝에 서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9 월 25 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정치, 사회편'을 주제로 제 8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자리에 참석한 다양한 논객들은 각종 정치, 사회적 문제를 놓고 통찰력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원흉은 다름 아닌 수명을 다한 공공 시스템"이라 지적하며 제 7 공화국으로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상래 국민통합운동 상임운영위원은 언론의 선동과 과잉민주화를 이 모든 것의 병폐로 생각한다고 비판하였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막론하고 우리 정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이제 한국의 정치는 정과 반의 단계를 넘어서 합의 단계로 나아갈 때 성숙해질 수 있다"라 앞으로의 방안을 제시했다.



과연 각자의 이념, 이익이 난립하는 가운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정과 반의 합을 어떻게 이룩하냐가 아닌가 싶다. 각자의 정, 각자의 반만을 주장하고 싸우느라 모든 것이 멈춰있는 지금. 합의 단계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합의 개념은 헤겔의 정반합에서 나온 개념이다. 정반합의 최종 단계. 하나의 주장인 정(正)이 모순되는 다른 주장인 반(反)과 서로 대립하는 단계를 넘어서 더 높은 종합적인 과정에 도달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 합리적인 주장이 도출된다.



대한민국에 우후죽순 일어나는 시위현장

하지만 우리나라 곳곳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합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된다. 여기저기서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의 두뇌를 담당하는 국회조차도 자그마한 안건조차도 협의를 못해 마비상태에 이르렀으니 합의 단계는 잡을 수 없는 별처럼 느껴진다

어째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우리는 최종 단계인 합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마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은 '패배'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려서 부터 객관식에 익숙해져왔다. 한 가지 보기 외에 모든 보기는 오답으로 처리되므로 자신이 주장한 답이 객관식 답이 아니면 여지 없이 오답처리 됐다. O 아니면 X 뿐이였다. 선생님께 이건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고 따지려하면 "어느 정도는 없다. 100%만이 답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O아니면 X뿐인 객관식형 시험

이러한 교육에 익숙해진 우리는 당연히 자신의 답 이외는 오답이라는 사고에 익숙해졌다. 자신의 주장은 완전무결할 수 없으므로 다른 이들과의 수정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O 아니면 X 뿐이었으므로.

그렇다면 원인은 밝혀졌다. 객관식형 인간을 더 이상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현재 주관식의 비율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객관식형 인간을 탈피하려고 노력중인 것이다. 그러나 주관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결국 답은 객관식마냥 하나로 정해져있다.

이유는? 채점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하면 형평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해 줄 인원도 부족한 형편이다. 객관식을 탈피하긴 해야 하는데 이것처럼 공평하고 손쉬운 방안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

교사 본연의 목적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업무 체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사의 업무를 보면 학생교육 이외의 기타 행정적인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교육 역시도 쉬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은 아니라 과도한 행정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

우선 교사의 업무를 학생 교육에 집중하고 기타 행정적인 업무는 추가적인 인원보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후에 기존 객관식 위주의 평가방식에서 서술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전환으로 발생하는 인원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교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된다.

현재 자그마한 논의에서도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심각한 정체 속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높은 단계인 합의 단계로 나아가야만 생존할 수 있고 고인 둑을 터뜨려 바다를 이루게 할 수 있다.

교육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을 교육에서 찾아보았다. 우리는 한국 교육의 특징인 객관식형 인간의 양성을 먼저 멈춰야 한다. 다양한 답이 있고 다양한 방향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인력을 보충해줘야 하며 교사가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현재의 대립, 분열만 보이는 대한민국은 분명 어딘가의 병이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 원인을 객관식형 인간의 사고에서 보았고 이는 분명 교육을 통해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分이 아닌 合이 떠오르는 그런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⑥ 손민지(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공자의 정명(正名)사상을 배우자.

지금 대한민국은 내부적으로 이념,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어 그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당리당략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8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갑제 대표는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여야를 비판하고 선동적인 언론의 문제를 꼬집었으며, 또 다른 발제자인 강규형 교수는 현재 정치권에서 좌우를 초월한 공통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에서 합을 지향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래 상임운영위원은 바람직하지 못한 언론의 모습을 비판하며 언론인들의 직업윤리 회복을 주장했고, 더불어 시민으로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호 소장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공공시스템의 기능부전이라고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7 공화국 건설을 위한 국민운동을 주장했습니다.


공공시스템의 기능부전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상 최악의 출산율과 자살률, 양극화, 일자리 3 불(부족, 불만, 불안), 소모적 갈등과 가치 전도된 경쟁 등은 수명이 다한 공공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공공시스템의 기능부전 문제를 보며, 공자의 정명(正名) 사상이 떠올랐습니다.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당함으로 공자가 주장한 정명은, '이름을 올바르게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명명(名名)되는 것과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일치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유는, 이름을 올바르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름값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하고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정치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행정 관료들은 어떤가요? 크게는 세월호 참사, 작게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 비리사건으로 볼 수 있듯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비리를 저질러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료답지 못한 행동들은 사회정의를 흔들고, 극단적으로는 세월호 참사같은 최악의 인재를 만들어내죠.

언론은 어떤가요? 뉴스의 균형을 감안하지 않고 오직 시류와 선정성에만 몰두해 언론답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시민들도 정치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죠.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각자가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논어 안연편에서 공자는, 정명과 더불어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를 강조합니다.

정명과 일맥상통하는 말로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시민교육, 공직자 교육 등을 통해 정명사상을 기반으로 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는, 정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올바르게 하는, 선진화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지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RvCP0-HSR_Q

⑦ 송동근(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눈부신 경제성장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비약적인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계층과 세대 간 갈등,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 문제 등 대한민국은 어느 때 보다도 불확실한 미래와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외적으로 현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인데요.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9 월 25 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정치, 사회 편' 이라는 주제로 제 8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명사들은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를 보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여러 의견들과 해결방안들을 제시해주셨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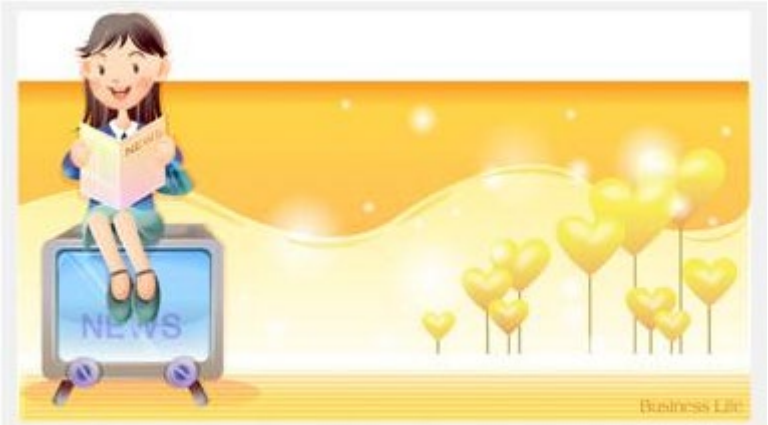
이 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국 정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혼란을 통제하지 못하는 언론의 문제점과 정당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선동적 노선에 집착하는 야당에 일침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우파진영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이신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비유하시며 중우정치로 인한 한국이 헝그리(hungry)사회에서 앵그리(angry)사회로 전이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에 교수는 긍정적 인식의 필요성을 중요시며 공화주의적 애국 교육안 해결책을 주장하셨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몰아가는 본질적 문제의 원인을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며 공공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의 기능부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이신 이상래 국민통합시민운동 상임운영위원께서는 시민으로서, 언론인으로서의 바람직함을 강조하며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시민교육프로그램을 통합시켜 제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중에서 특히 이상래 국민통합시민운동 상임운영위원의 말에 주목이 되었고 깊이 공감하는 바인데요.



단일매체가 아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상을 봐야한다

언론의 선동은 국민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질뿐더러 국가를 움직인다는 말을 사용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power 와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예로 대 참사인 세월호 사건 때를 생각해 보았을 때도 언론의 힘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언론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는데, 정작 언론 측에서는 별 다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세태와 방편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결방안으로 저는 국민의 의식개혁이 우선 전제로 깔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말해보자면 국가의 힘에 맥없이 당하는 언론의 힘과 수를 줄이고 국가를 위하며 정의에 당당히 맞서는 청년 대학생 기자단이 구축된다면 조금이라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지며 국민들의 의식개혁도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주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현재만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해결방안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훗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청년들을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데 한 몫이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대국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없다면 더욱 더 빠르고 강대한 발전이 될 것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내전을 꼭 멈추어야 하며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히, 열심히, 부끄럼 없이 정명사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대한민국이 최강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갑시다!

⑧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과)


토론하는 문화와 교육제도는 선진화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위기', '불신', '불안'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나타내는 가장 키워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대체 왜 이런 상태에 봉착하였으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정치, 사회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과 일반국민들, 기업가들과 사원들, 그 외에도 계층별, 성별 등등 각계각층이 각자의 목소리만을 높이고 있으며,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위한 법안과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인들은 이념적인 논쟁과 정당간의 대립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법안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민망한 국회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제적으로 큰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회의 중 등장한 전기톱, 해머 등은 각종 신조어를 만들며 국회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강성노조의 불법투쟁과 제 밥그릇만을 챙기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권익신장을 방해하고 사회의 소통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무엇인가?

원활하지 못한 소통은 사회적인 불안과 국민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였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상황과 안정화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여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입시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단순한 입시위주의 주입식교육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개인주의도 심화시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친구들, 타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야기하고 기본적인 소통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인데 개인적인 속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사회적 가치와 상충되어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제도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제도를 수정한다면 점차 사회적인 제도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는 분명 변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자!!!

프랑스의 대입시험, '바칼로레아'는 정해진 답이 없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내어 답을 쓰는 시험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장소, 상대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기회도 충분합니다. 또한 어른이 되어서도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며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불안과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과 소통이 원활하다면 불신과 불안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소통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자세를 함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교육방향과 제도부터 토론위주의 학습과 사고할 수 있는 과정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의 출발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소통함으로써 다시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경쟁과 이기주의가 불통과 불신의 사회로 이어졌듯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여 선순환을 재생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국토의 규모도 작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뿐이고 인적자원이 곧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OECD 에서는 각 국가들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영어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년 핀란드 및 북유럽국가, 인도 등과 함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의문입니다. 2010 년과 작년의 수치를 비교해 볼 때 모든 영역에서 소폭 하락하였으며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토론하는 문화와 교육제도는 선진화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인적자원의 진정한 경쟁력은 토론하는 문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 수용하려는 태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시작은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지하자원은 없지만 선진시민의식과 교육제도를 통해 선진국이 된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칼로레아를 갖춘 본 프랑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력이 10 권에서만 맴도는 이유가 창의력이 부족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 불신으로 가득차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변화를 이끌어 내고, 변화된 개인이 사회에 진출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쇄신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지 않을까요? 선진화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⑨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분열되어 끊임없이 다투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국내적으로는 이념,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및 경제 질서가 큰 혼란을 겪고 있어 벼랑 끝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선동적인 언론, 反민주적인 야당, 전교조 등은 계속해서 폭주하며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정치·사회)"를 주제로 9 월 25 일에 월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여러 의견들과 해결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구할 반공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창당되어야 한다고했고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대한민국을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공화주의적 애국의 덕성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수명을 다한 공공시스템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핵심 원흉이므로 6 공화국을 혁파하고 7 공화국을 건설하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래 국민통합시민운동 상임운영위원은 언론인들이 직업윤리를 되찾고 과잉민주화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시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번 월례토론회에 참석한 뒤 한국 정치와 사회의 상황이 내전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전을 일으킨 주체는 야당과 전교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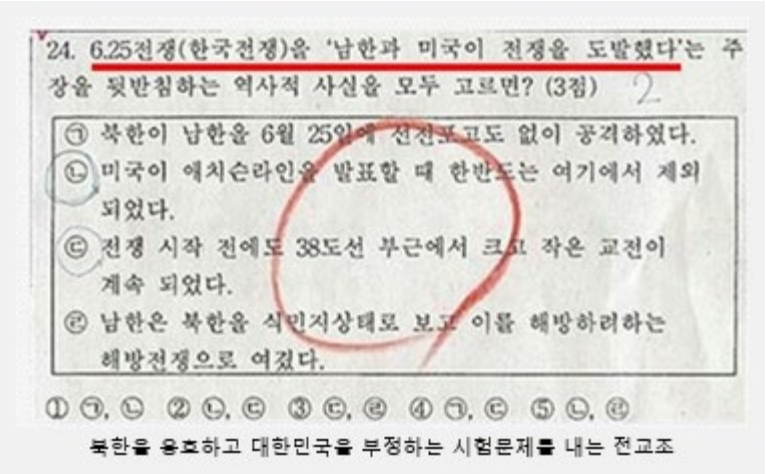
견제를 통한 균형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야당은 견제가 아닌 무조건적인 반대와 끊임없는 정쟁을 통해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모든 야당 의원들이 함량 미달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부 목소리 큰 강경파들이 당권을 잡고 흔들며 폭주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강경파들은 종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운동권 출신입니다.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부르고 대선에 불복하며 대통령을 원수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 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정쟁이 있어야 자신들의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정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을 고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국민이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나라를 좀먹으며 정쟁을 유발하는 정치인들을 투표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이 앞장서서 정치인들에 대한 한치의 거짓, 왜곡 없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을 그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조갑제 대표님의 말씀처럼 반북성향의 사회민주 정당과 선명한 반공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나라를 고칠 지금의 정치인들에게는 없는 정열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된 바람직한 진보, 보수정당들이 창당되어 우리 정치를 개혁한다면 무조건적인 반대와 정쟁이 아닌 견제를 통한 균형이 이뤄지고 올바른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24. 6.25전쟁(한국전쟁)을 '남한과 미국이 전쟁을 도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을 모두 고르면? (3점)

㉠ 북한이 남한을 6월 25일에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하였다.
㉡ 미국이 애치슨라인을 발표할 때 한반도는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 전쟁 시작 전에도 38도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교전이 계속 되었다.
㉣ 남한은 북한을 식민지상태로 보고 이를 해방하려하는 해방전쟁으로 여겼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시험문제를 내는 전교조

전교조는 야당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사파의 사상을 주입하여 학생들을 종북주의자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운동권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서 정치, 역사, 사회적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전교조 교사를 만나면 1 년도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세뇌될 것입니다.

지금의 20 대, 30 대는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심하게 판을 칠 때 학창시절을 보냈고 그 결과가 지금의 50, 60 대와 20, 30 대가 갈등하는 현실로, 좌파와 우파가 협력이 아닌 대결만 하는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들입니다. 학생들에게 정치사상을 주입하며 세뇌시킬 권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들을 자신들의 도구로 활용하는 전교조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학생들을 세뇌시키려는 교사가 있다면 처음에는 경고조치, 그 다음에는 특별연수를 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해직시켜야 합니다. 나머지 전교조 교사들이 이렇게까지 해도 멈추지 않는다면 전교조를 해산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10 년만 더 지속돼도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사가 될 수 없도록 인성검사, 면접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사가 된다면 전교조가 없어지더라도 학생들이 계속 세뇌당하고 지금의 분열된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사방이 세계 최강국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독재국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21 세기 대한민국 내전은 똘똘 뭉쳐도 부족한 우리의 국력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전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야당의 문제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고 똘똘 뭉쳐서 정치, 사회의 선진화를 이루고 제 2 의 한강의 기적,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⑩ 이희진(선린대학교 간호학과)



이념,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과 혼란이 많은 우리나라

온라인 공간은 마치 전쟁터와 같고 사회적 이슈는 빠르게 끓어올랐다가 사그라드는 오늘날, 여야의 문제와 함께 언론의 선동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9 월 25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이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Ⅰ)-정치·사회 편-'을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각종 정치 사회분야의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제 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민주주의조차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장외투쟁에서는 종북(從北)성향 세력과도 공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제 7 공화국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상래 국민통합운동 상임운영위원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제자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우리 온라인 공간은 한때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태국과 같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면서 광우병 사태만 봐도 이러한 온라인 공간의 증오와 분노가 사회로 쉽게 전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나라가 공화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화주의는 자유, 평등, 공공선 그리고 법치를 핵심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교육하고 사실을 알려 어떤 문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자는 언론사의 수를 줄이고 내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언론사는 학생 인턴기자를 선정하여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세대별로 다른 시각을 보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의하면 현재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해 2877 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신들만의 기형화된 정치색을 띠는 가운데, 규모가 작은 언론사의 경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를 쓰곤 합니다.

혹은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시청률과 구독률이 낮아 그 영향력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모든 분야의 기사를 내기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 언론사가 있어 각 분야에 대한 좀더 심도 있고 폭넓은 기사를 쓴다면 그저 언론사의 경쟁과 선동의 문제가 아닌 공정하고 내실 있는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대학생 기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대학생 언론인과 현재 기성세대 언론인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침체되지 않은 건강한 언론인의 정신을 일깨워 가고, 학생들은 선배들의 활동을 통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하여 언론인으로서 지성, 객관성,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을 가질 것을 다짐하는 지속적인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운 자유, 평등, 공공선 그리고 법치의 개념을 사회적 사건에서 발견하고 더욱 신선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SNS 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SNS 를 통해서 무분별한 정보에 대해 길잡이가 되고 온라인상의 검증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선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론과 국민의 변화

세대 간의 소통의 부재와 그에 대한 불만이 온라인상에서 표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불신을 더욱 확대하고 극단적인 이념에 빠지도록 선동하기도 합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오늘날, 각 분야에 전문성을 둔 언론사들이 많아지고 대학생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한다면 우리나라도 튼튼한 뿌리를 가진 선진국 대열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⑪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우리 사회에 첨예한 이념갈등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선진화포럼 9 월 월례토론회에서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필자는 조갑제 토론자의 발제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자유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역사적 의무, 그리고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를 대통령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사회의 이념 갈등과 연관되어 있는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필자는 국정 교과서 문제를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가?

소위 말하는 좌편향 교과서를 비판하는 논리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북한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공산주의 세력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면 그들은 헌법정신과 의회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악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위시한 정권이 교과서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생의 알권리와 교사의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헌법정신에 맞지 않을뿐더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몰락한 형국에서 헌법을 부정하는 종북 또는 공산주의자라는 꼬리표는 시대착오적이며 편향적인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친일·독재 미화와 숱한 표절·오류 등으로 비판받은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전폭적인 비호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0%나 다름없는 채택률을 낸 사실, 아시나요? 과연

우편향적 역사서술에 반대한 모든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당성을 부정했으며,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종북 세력일까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과오를 반성하는 균형잡인 역사적 안목이 필요하다.

외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1948 년 정부 수립 이후 의회민주주의와 다당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채택하여 높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현재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이 되었지요.

위와 같은 성과를 받아들이고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면, 외면적인 성장 이면에 감추어진 어두운 면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식민지 치하의 고통과 비극적인 한국전쟁과 분단,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를 일구어 오면서 지독한 독재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이 자행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로 아무리 포장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현재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은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애써 모른척한다고 사실이 변할 수는 없겠지요.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전진은 없습니다. 일각의 비판처럼 학생들에게 패배주의적인 국가관을 심어주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독일은 수 십년 전부터 나치의 역사적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정치적·문화적으로도 전혀 다른 체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덕분에 유럽에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지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전진은 없습니다.

비단 한국사뿐만 아니라 어떤 교과서든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교과서 국정체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은 유신 시대가 아닙니다. 교과서 국가 발행이 독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수단이었던 역사를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⑫ 정복윤(고려대학교 정경학과)



위기의 대한민국, 탈출구는?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경제성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정치 등 국가를 지탱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속속히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필자는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제 88 차 월례토론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의 주제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I)'로서, 정치·사회 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갑제 대표는 여야의 바람직한 균형과 이를 조정하는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규형 교수는 강하고 건전한 야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좌우를 초월한 공통가치를 찾아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호 소장님은 정치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지탱하는 공공시스템의 미진함을 설명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7 공화국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래 위원님은 언론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인들의 직업윤리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잉민주화의 폐해는 시민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는 서슴없는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특히 김대호 소장님의 공공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월호 사태에 공공시스템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공공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공공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이에 대해서 한국의 공공시스템 문제는 '규제와 인재'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규제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되고, 심지어 규제가 너무 많아 이를 지키는 것조차도 어렵게 된 실정입니다. 이로서 공공시스템을 지탱하는 나름의 규칙이 올바로 작동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공공시스템의 부진은 '인재'의 문제로도 비롯됩니다. 결국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의 순간판단이 긴급상황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의 허술함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했더라도 이를 개혁하려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를 타파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갖춘 인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자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벼랑에서 탈출할 지혜를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창업국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세계를 호령하는 창업국가가 될 수 있었는지 분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규제와 인재의 문제를 일찍이 극복한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신의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앱니다.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창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부는 창업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창업에 대한 규제도 최소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젊은이들이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었고 이러한 도전은 곧 수많은 외국투자자들의 자본유입으로 이어져 경제부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스라엘과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앴다면 한국은 지금 꼭 필요한 공공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이를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정부가 공공시스템의 규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장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감시의 주체로서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창업국가 이스라엘은 과연?

또한 이스라엘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본바탕은 바로 '후쯔파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은 개방적, 비판적 태도를 중시하는데 이를 후쯔파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상사에게도 오만하게 질문을 하며 비판을 서슴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용인되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스라엘의 후쯔파 정신이 한국 사회에도 어느 정도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나름의 권위주의적이며 피라미드 전달체계가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는 조직 개선의 여지가 적습니다. 한국에서 공공시스템의 문제가 생기면 상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이 주인의식을 갖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인재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긴급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서는 긴급상황 속에서 상사가 판단력이 흐려지면 후배들이 상사를 직위박탈시키고 자신들이 상황을 이끌어나갑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이를 과감하게 실천하는 인재들이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재양성은 한국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객관식으로 정해진 답을 찾는 교육이 아닌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상대방과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갖춘 인재가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시스템에 많은 약점들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점들은 '규제'와 '인재' 때문에 완전히 극복되기 힘듭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서 규제를 줄이고 올바른 정신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이로써 벼랑 끝에서 벗어나 이스라엘과 같은 강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⑬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벼랑끝의 대한민국 언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국내적으로 이념,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및 경제 질서가 큰 혼란을 겪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대립과 분열을 해결하기보다는 이해관계로 점철된 소비적인 논쟁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9 월 25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에서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선동적 노선에 집착하는 야당과 국회를 식물화하는데 일조한 여당을 지적하시며 제대로 된 우파진영의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제발표자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학과대학원 교수는 실제적 공동체 성숙을 위해선 자유, 평등, 공공선, 법치를 핵심가치로 하는 공화주의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토론자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문제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있으며 특히 공공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의 기능부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래 국민통합시민운동 상임운영위원은 선동과 자극적인 편파 왜곡보도하는 언론인들의 직업윤리 회복의 시급함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언론의 편파적 왜곡보도 및 선동을 막을 수 있는 팩트체커(Fact Checker)

저는 월례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에 상당히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균형잡히지 않은 언론은 우리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동과 선정성에만 몰두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줬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승객들이 구조됐다는 오보, 신분확인이 안된 '자칭' 잠수부를 뉴스에 그대로 내보내 대중과 정부 간의 갈등유발, 이후 세월호법을 둘러싼 유가족들 및 관계자에 대한 편파보도가 그것이었습니다.

현재 대학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 시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언론에 선동된 대학생들이 전단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7 시간'이 아니라 제대로 인명구조가 안되었던 우리나라의 안전시스템에 있는데 말이지요. 언론의 선동은 우리사회를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과거 언론사에는 '팩트체커(Fact-Checker)'라는 직함이 존재했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선에서 취재하고 기사를 써오면 보도되기 전 일일이 그 사실을 점검하는 역할이었지요. 현재는 그 역할이 기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일임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의 문제점인 편파적인 보도는 바로 객관성과 정확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팩트체커가 제 3 의 시각에서 다시 보고, 사실확인을 한다면 대중들을 호도하는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돼야할 기자윤리교육

우리나라의 언론사는 몇 개일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언론사들이 100 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은 대부분이 모두 이러한 언론사에 속해있습니다.

기자는 한 언론사의 구성원으로서 출입처를 맡아 취재해 기자의 전문분야를 만들고 깊이있는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 말한다면, 출입처에 마땅한 기사가 없을 땐, 필요없는 사건을 부풀려 쓴다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보도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외국의 경우 기자들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기사와 심층적인 기사를 작성해 언론사에 판매를 해 보도를 하는 식이지요. 그중에는 언론사의 기자들보다 단독특종을 더 잘 잡아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자들도 특정 언론사에 몸을 담고 출입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진상보도, 공정하고 심도있는 분석보도를 위해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인 듯 합니다. 기자가 언론사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임한다면 훨씬 더 올곧은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기자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특종을 위해서라면 선동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사진, 어떤 것이든 동원해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우리나라 언론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언론사는 기자선발 때 단순히 기사작성법 등 실무적인 교육 외에도 기자의 윤리강령과 시민의식에 기초한 이론중심의 교육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앙기구에서 오보나 중요한 실무적 과실의 잘잘못을 따져 징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각 언론사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자에게 일정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3 진아웃' 등의 강력한 제도적 체계도 필요할 것입니다.



선진사회에 앞장서는 건강한 언론, 정론직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사실과 객관성에 기초한 언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언론이 되려면 사실보도를 가능케하는 팩트체커, 프리랜서 기자들의 확대, 기자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감시견으로서의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공평 정당하게, 의견이나 주장 등에 구애됨 없이 있는 그대로 적겠다'라는 '불편부당 정론직필(不偏不黨 正論直筆)'의 책임을 다한다면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타파하고 건강한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서울대학교에서 제2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였다.

박성찬(재료공 3) :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기간인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을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2 가지 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정반(正反)을 넘어서 합(合)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객관식형 인간 탈피의 방안이고 두 번째 주제는 현재 국회의 상황 인식과 건강한 여야당을 만들기 위한 대학생 차원의 노력 방안이 무엇이 있을 지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반에서는 정, 반의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헤겔의 변증론에 따르면 이제는 정, 반을 넘어서 합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ㅇ아니면 x뿐인 객관식형 시험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객관신형 인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 보기 중에 한 가지 답만 존재하고 나머지 네 개는 그 내용에 상관없이 모두 오답으로 치부해버리는 사고에 익숙해진 이러한 인간상은 합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까요?

우선 저의 의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객관식형 인간을 양성하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옳은 것만 답이고 나머지는 모두 오답을 취급하는 방식에 익숙해져서 답 or 오답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너무나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 흔히들 많이 언급하고 그에 대한 해답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바로 논술형 시험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 때 자주 등장하는 예시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입니다. 하지만 논술형 시험의 도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프랑스의 대입 시험 '바칼로레아'

우리나라에서 교육평가 시스템은 객관식이 아니면 그것에 대해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원은 정해졌는데 논술형 시험은 그 문제 출시, 채점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데 이를 현재의 교사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교사의 업무 분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교사의 행정 업무 제로화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교사가 행정 업무에 교사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논술형 시험을 도입하고 교사는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된다면 현재의 교육 시스템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사는 교육에만 집중하되 행정업무는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한서(재료공 2) : 박성찬 학우의 말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당장은 하기 힘든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선의 교사의 경우는 객관식형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논술형 시험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교원을 뽑을 때 논술형 시험을 전담하는 인원을 따로 선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다양한 수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논술형 시험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술형 시험 역시도 답을 위한 논술로 흘러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논술이라는 특성상 과정을 필연적으로 고민하고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풀어쓰는 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단점이 존재하더라도 객관식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교육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오주현(재료공 3) : 저는 집에서의 교육 역시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즘 다양한 TV 예능 프로그램을 봤듯이 어릴 적 교육이 어린아이의 행동과 사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릴적 집에서의 교육이 학교에서의 교육보다 더 근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은 항상 옳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에 비해 부모님의 지혜가 더 크기에 옳은 경우가 많지만 이런 식의 교육방식과 말투는 아이들로 하여는 '절대답'이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답이 있다는 생각은 절대답에 집착하게끔 만들고 다른 것들은 용인하지 못하게 만들어 아이들의 사고를 경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교육하듯이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역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다른 답도 있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교육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부모님이 답이 아니라 다양한 답이 있고 과정을 따라 답을 유출해나가는 연습을 시킨다면 학교에서의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균(재료공 3) : 합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객관식형 인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고 동일시 여기는 생각 또한 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흔히들 이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바로 자신의 주장이 곧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에 헛점이 있어 그것에 대한 지적 또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를 마치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욕하는 것 마냥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자신의 의견은 나 자신이기에 건들지마라~하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토론할 때마다 미묘하게 언짢은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집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견과 자신,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당론을 중심으로 서로 양보치 못하는 국회의 모습

김정은(재료공 2) : 저는 범위를 좁혀 국회 안에서 합의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당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실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회의원들의 양심고백에 의해 현 국회가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론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당 내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찬성은 찬성만 있지만 반대에는 부분적인 반대, 전체에 대한 반대, 수정을 요구하는 반대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당론을 밀어붙이면 이러한 의견의 다양성이 묵살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내에서도 민주주의를 통해 살아있는 생각이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이뤄진다면 정, 반으로 단순히 분리되어 고여있는 지금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연속스펙트럼처럼 이어지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모여 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박성찬(재료공 3) :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현재 국회의 상황 인식과 건강한 여야당을 만들기 위한 대학생 차원의 노력 방안이 무엇이 있을 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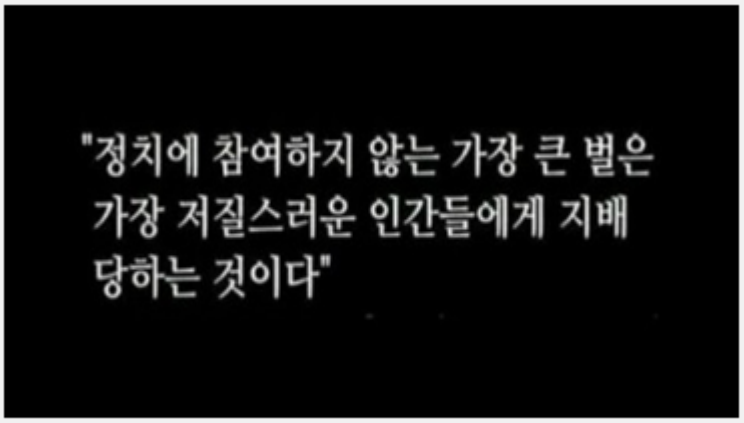


미국의 투표 영상 중 한 장면

이경풍(재료공 3) : 제 생각에는 대학생으로서 그리리고 한 국민으로서 건강한 여야당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딱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투표입니다. 지금의 국회를 보면 건강함이 결여되었다고 저희는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저희가 뽑은 것입니다. 그들 개개인은 의원선거에서 당당히 뽑힌 당선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 그가 어떻게 지금껏 살아왔고 어떤 공약이 있고 어떤 인물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차츰 쌓여 지금의 국회를 만든 것입니다. 감시자이자 집행자가 되어야 하는 국민이 그 역할을 소홀히 했기에, 방종 했기에 지금의 사태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외의 다른 노력보다도 '투표'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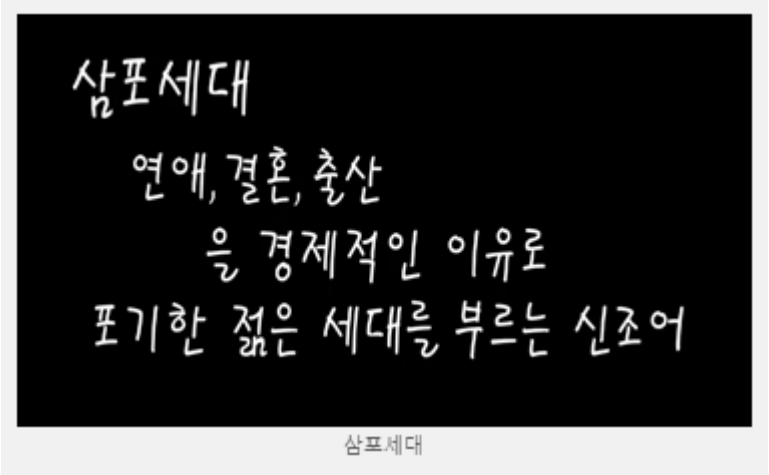
박성찬(재료공 3) : 저도 이경풍 학우의 의견에 백분 동의합니다. 저는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당을 지지하고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치활동을 하면 색을 가지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자리에서 조차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나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고 지금 시대의 애국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시대의 군인은 정치이듯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병사의 역할을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당을 지지하기에 책임감을 갖고 정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 활동이 자연스러운 대학생들의 문화가 되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더 깊고 튼튼한 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관점은 기존의 정치계의 신선한 자극이 될 뿐 아니라 긍정적인 감시자의 역할로 이어져 더더욱 건강한 정치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대학생 때부터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삼포세대

박한서(재료공 2) : 하지만 그 의견은 지금의 대학생들에게는 불가능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삼포세대, 88 세대로 불리고 취업에 치이는 대학생들에 당활동은 부담이고 사치일 것 같습니다. 대신 만약에 이러한 활동이 하나의 스펙으로써 인정된다면 가장 좋은 유도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성찬 학우도 말씀하셨듯이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오히려 취업에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교류하는 것을 사회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장려돼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써 정치활동을 취업과 연결짓는 것이 있습니다. 당활동을 기업차원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스펙으로써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전반에 흐른다면 대학생 세대로부터의 건강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균(재료공 3) :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이 합류하게 된다면 소수당들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거대당의 당론에 의해 경직적인 정책이 나오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에는 찬, 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듯이 정치 역시도 저는 多수로 구성원 少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少수로 이뤄진 多당이 존재하여 스펙트럼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힘이 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주현(재료공 3) : 저는 우선 대학생으로서의 정치활동인 학생회 활동이 좋은 방향으로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회 활동은 운동권이나 비리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서 투표 참여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식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총학생회 제도를 견고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권한이 축소되고 그 제도도 오래된 학생회 제도를 수정하고 실질적인 정책기구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고 친숙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위한 총학생회가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학생회로서 역할이 커진다면 학생들이 자연스레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정치활동을 해야겠구나 몸소 피부로 체험할 수 있어서 그 어떤 글과 광고보다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회 활동이 대학생 학업과 병행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3 학점짜리 수업으로 '학생회 활동' 이런 식으로 학점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찬(재료공 3) : 우선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객관식형 인간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여기셨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 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과 자신과 자신의 의견을 분리하여 인지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우선 투표가 국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생 때문에 당활동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의견에는 아직은 사회적인 인식이 정치활동에 부정적이라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취업에 애쓰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정치활동을 스펙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생의 정치활동인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정치활동을 일찍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주신 대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의견과 현실적이고 시도해 볼 법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더욱 뜻깊었던 자리같습니다. 이런 저희 대학생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모여 결실이 되어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이 다시금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제 2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가졌다.

임현수 (국문 4): 지금부터 제 2 차 서울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9 월 25 일에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던 월례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주제를 좁혀서 '현재 한국에 정착된 민주화의 형태가 과잉민주화인가? 민주화의 부재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월례토론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와 대안을 간략히 되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이념,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및 경제질서가 큰 혼란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야당은 내부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역량이 부족하며,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 7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언론의 선동을 바로잡고 과잉민주화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토론 주제를 '현재 한국에 정착된 민주화의 형태가 과잉민주화인가? 민주화의 부재인가?'와 같이 좁힌 이유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입니다.

특히 매 선거 때마다 저조한 젊은층의 투표율을 돌아볼 때,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을 선동하는 무리들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진정한 민주화의 의미를 되짚어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과잉 상태인가?

그럼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하자면, 저는 과잉 민주화 개념이 필요할 때 갖다 붙이는 정치적 미사여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잉 민주화의 폐단은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참여로 소위 중우정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깨끗하고 건전한 정부의 행보가 지나치게 방해될 때나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현 정권은 그만한 정당성과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일련의 사태는 스스로 민주화의 부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현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에 있어 과잉 민주화라는 말은 사치일 것입니다.

서명범(국문 3): 최근 검찰의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의 무차별 감청을 예고함에 따라 대국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이어 사이버 망명사태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감청은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지만, 개인적인 사생활 노출에 민감한 네티즌들의 눈을 피해 민간인 사찰을 시도하는 것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과잉 운운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사치라는 사회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박인우(서울지질 3): 박 대통령의 '모독 발언' 이후 국민을 검열하는 상황은 선진국들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까요? 일개 동사무소 직원도 아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사건에 대응했는지는 국민이 당연히 알고 싶어하며 알아야 할 권리입니다.

담당자가 7 시간 동안 행방을 감추면 어떤 말단 공무원이라도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뭘 했는지 밝히라는게 왜 사생활일까요. 채동욱 검찰총장을 뒷조사하여 공인의 사생활을 문제삼아 몰아내더니 이제와서 개인의 사생활 운운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임현수(국문 4): 네. 최근 일련의 사태가 민주화의 과잉보다 민주화의 부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청(국문 4): 국정원, 경찰 등 국가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전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간첩 혐의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밝혀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자칭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에서 정권에 불리한 정보의 언급을 회피하는 현실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국민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민주적 정부인지 회의감만 더해집니다. 이래서는 중국이나 동남아의 후진적 독재와 무엇이 다를지 의문입니다.

서명범(국문 3): 무엇보다 지난 7 년 간 민주주의 퇴보, 부의 양극화,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 언론 공정성 훼손 등의 실정을 지속해 온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유리한 입장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비전이나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파 간 다툼, 서로 남의 탓만 하는 행태는 실망만 안겨주었지요.

제 1 야당으로서의 리더십은 없으면서 앞으로도 케케묵은 '심판론'만 들고 나오면 희망은 없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건국을 부정하는 종북세력 운운하며 색깔론을 고수하는 것 만큼이나 설득력 없는 울림에 불과합니다.

박인우(지질 3): 계파 간 다툼에 매몰되어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야당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민주화의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화의 부재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수(국문 4): 국가조직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검찰과 언론의 문제, 그리고 야당이 비전과 추진력이 없어 국민들이 등을 돌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화의 과잉보다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더 절실한 상황이라는 의견입니다.

박인우(지질 3): 사회자의 의견처럼, 선진국에서 민주화의 과잉이라는 말은 '깨끗하고 건전한' 정부와 권력의 행보가 지나치게 방해될 때나 예외적으로 명분화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정권이든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과 같이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 현실에서 민주화의 과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청(국문 4): 다양성과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에서는 합의 지속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지지고 볶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이지요. 독재정권의 효율성보다 국민의 주권에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건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도현(경제 4): 한편으로는 소위 '일베 또는 일베충'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에게 과잉 민주화가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공격하며 조작된 근거로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이들이야말로 이념 및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반헌법적 집단이 아닐까요?

자칭 '극우'라고 하는 일베 무리들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댓글들은 성적인 모욕감과 인신공격으로 점철되어 있어, 모든 네티즌뿐 아니라 보수층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범(서울국문 3): 동의합니다. 일베 사이트 무리의 가장 큰 문제는 네티즌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정부와 여당의 잘못들을 근거 없는 논리로 감싸며 야당에 불리한 유언비어들을 퍼트리고 선동한다는 점입니다. 저급한 시민의식을 가진 네티즌들의 이와 같은 깽판은 과잉 민주화의 예외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안도현(경제 4): 민주화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엇보다 청년층의 투표율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만 말이 많아봤자 변하는 건 없습니다. 가상공간에서 갑론을박만 할수록 무능하고 억압적인 집권세력은 공교해질 뿐입니다.

반대표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현재처럼 계속

간다면 결국 폭탄은 우리 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민간에서도, 투표를 독려하면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활발히 벌여야 합니다.

임현수(국문 4): 민주주의의 본질, 저조한 투표율, 그리고 국론을 분열하는 '일베' 무리들의 심각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문제들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얻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우리는 모두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행동하는 시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청(국문 4): 다른 것보다 젊은 사람들 깨어서 실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요원합니다. 따라서 투표 이외에 청년들이 활동하는 정당과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 보수적인 기성세대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경쟁 논리에 매몰되어 취업과 진로 고민으로 어느 때보다도 젊은이들의 고충이 심하지만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손으로 쟁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우(지질 3): 투표율은 민심과 권력의 정당성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과잉을 말하기 이전에 민주주의가 부재한 상황부터 고쳐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투표하러 가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투표 시간을 늘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난 2012 년 대선에서 끝끝내 6 시 이후로 허용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짧지 않은 임기의 국정 책임자를 선출하는 날에는 필요하다면 넉넉히 시간 안배를 해야 합니다.

임현수(서울국문 4): 지금까지 '현재 한국에 정착된 민주화의 형태가 과잉민주화인가? 민주화의 부재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투표율을 볼 때, 민주화의 과잉은 적당하지 않고 민주화의 부재라고 부르는 게 알맞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특정 인터넷 사이트 무리들의 편향성과 선동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과잉이든 부재이든 양쪽 모두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토론의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적당하고 성숙한 수준의 민주주의가 아닌 극단의 속성들을 두루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깨어있는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행사하고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2 차 서울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고려대학교에서 제 2차 선진화연구모임이 열렸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벼랑 끝에 놓인 것과 다름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 월 25 일에 한국선진화포럼에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정치·사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토론회의 내용 중 일부를 뽑아서 대학생 버전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당들이 건전한 진보, 보수의 형태를 가지는지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임성균(고려대 식자경 2) : 일반적으로 주요 당들이라고 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과 기타 야당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건전한 진보와 보수의 형태라고 한다면 상호 견제와 비판을 통해 한 세력의 독재를 막고 바람직한 국정운영을 힘쓰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의를 근거로 했을 때 과연 누가 지금의 여,야당이 바람직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수는 기존의 바람직한 법과 국가조직의 형태, 그리고 기존의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는 기존의 형태에서 불건전한 것들을 비판하고 개혁해나가는 역할을 가지며, 새로운 가치로 더 나은 형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상반된 가치 속에서 타협점을 찾아내기 위해 투쟁하고 협력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의 보수, 진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들려오는 허구한 날 들려오는 싸움소리는 더 이상 큰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나 집회 역시 변질되어 각자의 이권추구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권력다툼에 먼저 신경을 쓰는 듯 보이며,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에는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미뤄두고 저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4 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국민에게 엎드려 한 표를 청원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국민에게 행사하려 합니다.

권력다툼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모습을 보입니다. 각자의 가치를 내세워 그 정당성을 설명하기 보다는 상대의 가치를 변질시키고 깎아내리며 국민이 이를 지지하기를 원합니다. 보수는 '수구꼴통, 친일, 독재',

진보는 '종북, 빨갱이' 등의 변질된 모습으로 서로를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고 상대당의 의견과 존재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마치 조선 후기에 붕당정치에서 서로를 제거하는 환국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민생을 논한다던 이들은 민생에 대해선 털끝만치도 알지 못하고 그나마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들은 거대한 정당의 입김에 눌려 버리거나 '일베충' 또는 '종북' 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돌멩이를 맞고 죽어 나갑니다. 누군가를 보수, 진보라고 부르는 것조차 그 이름이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를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정치상황을 봅시다. 프랑스에는 공산당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공산당은 존재할 수가 없지만 이미 패망한 공산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들은 모든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 견제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적인 비난이나 흑색선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각자의 진보, 보수의 가치를 당당히 표명하고 이를 위해 건전한 토론을 진행하여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뀌어가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존재가 서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면 파탄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각자가 서로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비판을 하고 시위를 하고 토론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되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택(고려대 식자경 2) : 우리나라의 우파는 외국의 극우에 가까우며 우리나라의 좌파는 외국의 중도우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김어준 씨가 쓴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확실한 방향 수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진짜 보수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따라가는게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기존의 가치를 기득권 세력이 침범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저항해야 한다고요. 우리나라의 정치에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단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정말 그야말로 질떨어지고 수준낮은 정치입니다. 더 나은, 더 지킬 만한 수많은 고귀한 가치들이 존재하는데 어찌 이것을 두고 단지 내 눈앞의 돈 만원에 집착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상대의 잘못 하나 하나에밖에 집중할 방법이 없지요. 흑색선전도 정도가 있는 법이지요. 정대한 방법으로 자신의 색깔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드러내고 조금 더 고귀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그저 당신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내 밥그릇을 지킬 수 있다는 식의 싸움입니다. 이래서야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조선희(고려대 식자경 2) : 절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양당제와 다름없는 형국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이라는 두 당이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판을 이끌고 있는데, 이 두 당에는 아주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당의 색깔을 대변할 수 있는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극좌부터 극우까지 각자의 색깔을 대변하는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탄탄한 이념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투표 때마다 그 활동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두 당에는 그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이념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회 현안이나 정치적 쟁점에 대응 할 때에도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고 있을 뿐이지 각 정당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각 당의 주요 활동들을 각각 나열해 둔 뒤 당의 이름을 지워버리면 어느 활동이 어느 정당의 활동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그 정당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당 안에 존재하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새누리와 새민련은 정당의 덩치를 키우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각자 당의 '이념'을 찾고 이에 반하는 사람들은 내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준수(고려대 식자경 1) : 저도 또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라는 단어로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갖가지 교묘한 편법과 술수들을 자연스럽게 포장합니다. 또한 군사정권 시절 지나친 맹목적인 정신교육으로 인하여 윗세대 분들은 보수당에 대한 근거없는 신뢰, 맹신이 자리잡혔습니다.

이는 보수당 내에서의 당 개선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무조건적인 지지가 새누리당 내의 웰빙주의자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진보 형태는 갖추려고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정치적 이익에 따라하는 행동이 오락가락하거나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보도 명확한 원칙과 지향점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는 한, 진정한 진보라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김창환(고려대 식자경 2) : 다들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또한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당과 진보를 자처하고 있는 당 모두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둘 다 확실한 보수와 진보의 노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추어 뚜렷한 정치색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 측 모두, 감정적인 시민 여론을 의식하여 감성을 자극하는 쇼를 많이 보이는데, 이는 건전하고 성숙하고 진보 보수 형태가 아닙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표를 얻어야 정치를 할 수 있지만, 너무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감성을 이용하려는 가증스럽기까지한 '정치인'들이 많은데 이는 공리적으로 전혀 건전하지 못한 지식인의 기만행위입니다.



대학생들의 85.3%가 불신하는 정치인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다음으로 두 번째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수(고려대 식자경 1) :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갖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 개선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서명운동이나 시위 등의 정치 참여를 하면,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이상한 데서 선동되었다..' 등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곤 합니다. 물론 극단적이거나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웬만한 선에서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 교육 부실, 취업난과 경제적 여건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성균(고려대 식자경 2) : ‘정치적’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되는 것이 저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에 정치색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논의에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이제 이 단어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겠고 또는 현재 정치상황에 대한 강한 회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국가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일 것입니다.

정치과정에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야만 관심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과 SNS 와 같은 매체를 통한 전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이야기와 선동 등 조작되기 쉬운 매체라는 것입니다.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인터넷 매체로 전파될 시에는 많은 이들이 접근 가능하고 이에 대한 토론, 토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거짓된 정보와 유도로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내는 사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 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간베스트’나 ‘오늘의 유머’ 같은 사이트들은 각자가 보수, 진보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사이트입니다.

청년층의 접속률도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정치색을 띠고 외부로는 서로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내부로는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수용을 보입니다. 이러한 집단 극화는 새로이 접근하는 청년층들에게 정치에 대하여 잘못된 관념과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층들에게 바람직한 정치 관념과 관심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실적이고 거짓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그 내용을 무엇이고,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자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1) :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고 지식이 깊지 않아서, 정치인들의 행보를 싫어하지 이성적인 대안이나 시각은 부재된 채로 정치판을 바라봅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게 아니라 청년들이 올바른 정치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도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노란리본을 내세우며, 현 정부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실히 대안을 내려기보다는 무언가를 처벌하려는 정의의 사도 같은 이미지를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저 자극적이고 1 차적인 정보만을 주관적인 SNS 글이나 자극적인 헤드라인 뉴스에서 습득하고 빠른 판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것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글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글은 음모론적인 소수의 목소리를 내는 듯한 이미지가 있고, 읽기 쉽게 친숙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접근 용이하고, 신뢰성을 주는 장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양측은 모두 자료를 우선 접근하기 친숙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논설같은 고급 자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청년들이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는 코드로 여러 방향으로 자료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여러 시각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선희(고려대 식자경 2) : 저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미 정치에 대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정치에 관해 아주 잘못된 정보들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주로 시사나 정치에 관한 정보를 얻는 루트는 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의 사회연결망 플랫폼과 또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입니다.

이곳들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날조된 자료들,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 양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퍼지는 것의 배후에 반국가적인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극적으로 날조된 자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보다는 자신들이 쉽게 얻고 있는 잘못된 자료들을 더 신뢰하고, 그것만이 숨겨진 진실이라 믿으면서 속칭 자신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부와 국가를 향해 기형적인 분노와 불쾌감을 표출한다. 청년들이 현실 정치와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 유통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사회연결망 플랫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예시로 '고양시청'을 들 수 있습니다.

고양시청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아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마스코트와 어미를 '고양'으로 통일하는 등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주민뿐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이에 반해 각종 정부기관 계정들은 그저 딱딱하게 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해 짤막하고 형식적으로 홍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처럼 사회연결망 플랫폼 담당자를 따로 배정하고, 각 기관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들과 형식적이지 않은 소통을 추구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에는 단호하게 해명자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제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대응하고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정보전달만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청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 들기보다는,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통은 절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주 흔하고 식상한 말이지만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청년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먼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택(고려대 식자경 2) : 저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에 목소리를 내는 때가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지금 손 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당장 지금 나서봤자 바뀔 것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할 행동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해봤자 내가 정치와 현 상황에 영향력을 미칠 방법이 전무하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무한한 동력을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언젠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6 월 민주항쟁과 우리 손으로 이뤘다고 할 수 있는 현재의 공로들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언젠간, 청년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란 것을 알 겁니다. 꼭 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인 ‘ 국회선진화법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박예슬(고려대 식자경 2) :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날치기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사이의 몸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회의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만 국회가 돌아갈 수 있어서, 자칫 여당과 야당이 타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거나 갈등할 시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자체는 필요하지만, 정치인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지 않도록 의식 개선이나 국회선진안법의 수정을 통해 법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임성균(고려대 식자경 2) : 법안의 날치기 처리 등을 막기 위해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이 지금은 야당의 떼쓰기 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많은 민생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전에 놓여 있고, 국회는 사실상 마비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선진화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껏 많은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처리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충분한 논의도 거쳐지지 않고 상정된 법안들의 질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토의와 논의의 시간을 가지고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은 상당히 민주적인 발전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지금 개선이 시급한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법안들이 논의도 되지 않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여당과 야당이 바뀐다 한들 미래에도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막음과 동시에 소수의 횡포 역시 견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국회를 진행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국회선진화법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것입니다.

조선희(고려대 식자경 2) :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취지는 아주 좋으나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법은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사례가 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신,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이 나와 버리면 국회의 의회활동을 '보이콧'해서 국회를 마비시켜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다수의 정당들이 자신의 이념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토론하고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형적으로 덩치가 커져버린 두 정당이 이념보다는 정치적 이권을 위해 무조건적인 반대, 무조건적인 찬성을 자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암 덩어리 같은 존재가 되므로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0일이 넘게 공전했던 국회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당들은 건전한 진보 보수의 형태를 가지는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국회선진화법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해봤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토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의견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고려대 식자경 2) : 저는 우리 나라의 정당과 정부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고양시청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연결망 플랫폼 담당자를 따로 배정하고, 각 기관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들과 형식적이지 않은 소통을 추구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제시하는 문제점을 무시하지 말고 바로바로 대응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청년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말하는 것들을 정당과 정부가 받아들이고 변화한다면 청년들은 정치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청년들이 잘못된 정보를 보고 선동되지 않도록 sns 를 포함하는 인터넷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성균(고려대 식자경 2) : 국회선진화법이 떼쓰기 용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상당히 민주적인 발전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떼쓰기 용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수(고려대 식자경 1) : 저는 모든 정당들이 자신들만의 가치를 갖고 이 가치에 따라 원칙을 세우고 우리 정치를 운영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의원들은 당에서 제명하거나 당원으로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과 같이 행동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오늘의 토론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다니면서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보수와 진보의 참된 가치를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sns 로 잘못된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의견, 지금의 국회선진화법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정책 제안으로는 정당과 정부가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벌하는 방안, 국회선진화법을 수정하여 이 법이 떼쓰기 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방안, 정당들이 자신들만의 가치를 갖고 이 가치에 따른 원칙을 세우자는 방안 등이 오늘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제시됐습니다. 이 의견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고려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2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였다

정복윤(고려대 정경학부 1) :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의 주제는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의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 해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던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은 최근 들어 그 증세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여야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정치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역시 그 공정성을 잃어가면서 신뢰할 수 없는 언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죠.

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며 화려한 비상을 이루었던 한국 경제에서도 그 균열이 점차 보이면서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마저도 세계 경쟁시장에서 그 위치가 흔들리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의 요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학우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의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서(고려대 정경학부 1) : 사회적 불신이 커지게 된 이유는 믿을만한 언론이 없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국의 언론자유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정치 등이 언론에 개입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스기사를 다시 검색해보니 한국은 '2014 년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57 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 년 연속 순위가 44 위와

50 위로 연이어 하락하면서 언론자유국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언론이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자유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언론을 접하는 태도를 바꿔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자꾸 편파된 언론을 믿고 넘어가기 때문에 언론이 시청자들을 연이어 기만하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올바른 시각으로 강력하게 비판하여 언론이 더 이상 편파되지 않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도를 회복하자!

구본웅(고려대 정경학부 1) : 강민서 학우의 말에 동감합니다. 저도 사회적 불신 문제에는 언론 편파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편파는 외부적 압력뿐만 아니라 이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온전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언론보도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론자체가 아닌 언론'접촉'의 편파성을 해결하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네이버 뉴스를 보면, 단일 기사를 통해 기사를 읽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건에 대해서 1 면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개의 기사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기사는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 면을 단일 기사가 아닌, 사건이름만 제시하고 사건을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그에 관련한 기사를 보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기사를 더 선호하겠지만. 적어도 모든 기사를 최소한 핵심은 보여주는 제목은 볼 수 있으니까, 언론보도에서 공정성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나현(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사회의 불안의 요인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지만 20 대로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또래학우들이 한국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요새 한국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꾸준히 신문과 뉴스를 접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그동안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다릅니다. 대학생들은 사회와 경제에 대한 이론만 빠삭할 뿐, 시사이슈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채 한국이 현재 어떤 국면에 처해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변에 관심이 없고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고등학생부터, 혹은 대학생부터라도 신문과 뉴스를 보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정윤(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한국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들이 빈약한 사회 안전망, 즉 빈약한 복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빈약한 복지는 창업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빈약한 복지는 개인의 실패에 대한 부담을 개인에게 전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 대책을 위하여 부동산에 투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길에 내몰리게 되고 그야말로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이 더 붙는 상황이 됩니다.

부동산 투기로 땅 값이 올라가는 것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집값이 비싸 집 장만이 어려울 경우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돈을 어느 정도 모은 뒤 뒤늦게 결혼을 합니다. 초산의 평균 나이대가 높아지고 일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육아 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니 출산율이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육아복지를 해결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하여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특성상 돈을 국내에서 쓰지 않고 돈을 벌고 외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를 늘리는 것은 국부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또한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에 유입시켜 한국인 노동자들과 가격 경쟁을 시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자면 빈약한 복지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더욱 빈약한 복지를 만드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의 원인이고 복지의 강화가 이 문제의 첫 번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원(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이정윤 학우의 말에 동감합니다. 이정윤 학우가 사회적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한국 경제의 위기가 사회 불안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을 부흥시켜주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애플이 신제품을 내세우면서 삼성 같은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대기업에 몰아주기 식으로 기업발전을 일궈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핵심 축인 대기업이 무너지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대기업 자체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을 뒤에서 받쳐주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은 실질적인 지원 없이 기술개발을 이루기 힘듭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본받아 세금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윤(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취업난도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회의 고학력자가 너무 쓸데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진학률은 80%로서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수준인데 안타깝게도 청년은 실업난을 면치 못합니다. 대학진학의 4 년이라는 시간에 기술습득을 통해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장과 함께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을 두드리니 이는 명백한 노동력의 낭비이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예로 독일의 마에스터 제도와 같이 청년들의 노동력을 각 분야에 분산시키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육성시키는 것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고학력자 양산현상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서정원(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이정윤 학우의 말에 동감합니다. 저 역시 취업난이 사회회적인 불안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클레멘트 코스를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 수업시간에 배운 것인데요, 클레멘토 코스란 저소득층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도 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평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배우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클레멘토 코스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한국에서도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다면!

심재인(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한국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군인들의 월급인상과 짧은 휴가의 횟수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각 군인들의 거주지는 다양하며 그 숫자 또한 60 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만약 군인의 월급을 올려주고 휴가를 많이 준다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소비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지인들을 만나 소비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정복윤(고려대 정경학부 1) : 한국 사회의 불신과 불안감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경제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경제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언론의 편파성을 지적해주셨고 사회문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태도 역시 문제가 된다고 제시해주셨습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대기업의 경쟁력 상실, 그리고 취업난 역시 사회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 보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주체성 신장 역시 해결책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문읽기 교육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인지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이 시급하며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마에스터 제도나 해외의 클레멘토 코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있었습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에서 열린 2차 선진화 연구모임

김현성(이화여대 방송 4):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 차 모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매체의 선동은 큰 문제입니다.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여 여론몰이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는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언론이 올바른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의 통합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타락하고 있는 언론의 여러 사태들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해보고 싶습니다.

이슬(이화여대 방송 4): 요즘처럼 언론의 타락이 심각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번 KBS 의 총리지명자 문창극씨에 대한 '악의적으로 편집된 과거 발언 폭로' 보도와 선전선동도 보면 국민전체를 혼란과 갈등을 일으켰었습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야당은 물론이고,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일부 여당정치인들까지 문창극 총리지명자에게 사퇴를 압박했었습니다.

이로인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는 신임 총리 한 명 임명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평가나 비판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성이나 정파적 이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인식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 드라마 〈뉴스룸〉 포스터

함희수(이화여대 광홍 4): 맞습니다. 저는 한때 미국 드라마 〈뉴스룸〉을 시청했었는데 ,이 드라마는 뉴스는 또 언론인은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선동하는 언론 세태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기억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사망여부는 뉴스가 아닌 의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 라는 말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 같은 말이지만, 시청자의 시선을 잡아 놓기 위한 무분별한 뉴스들, 세월호 사건에서 보인 우리나라 현 언론들의 민낯을 본 뒤라 이러한 '뉴스룸'의 오프닝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장면을 부러워하고, 놀라워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긴, 문창극 보도 사태와 관련하여 목회의 강단에서 청중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편집하고 끼워 맞추는 우리 언론이 할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단비(이화여대 방송 3): 근데 특히 저는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이 여론몰이 현상에 일조하며 타락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만나서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버디버디, 세이클럽, 싸이월드 그리고 현재 페이스북까지 저의 인생을 즐겁게 해준 매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친구들과의 친목목적의 시스템이 세월호 사건을 특히 보더라도 정치의 장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확인조차 되지 않는 각종 선동 글에 "좋아요" 를 무분별하게 찍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 친구들 사이에도 의견 대립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역대 대통령들마다 각각 인정할 부분이 있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주관적인 견해로 서로 각자의 성향을 우선시하며 헐뜯는 모습을 보면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북을 보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도가 지나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수단 목적으로 타락해버린 페이스북을 예전만큼은 잘 안하게 됩니다.

임소현(이화여대 작곡 3): 사실 이렇게 언론이 선동하는 이유는 권력과 언론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론은 처음 신문이 등장할 때부터 왕과 귀족의 정치 독점을 감시하는 데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습니다.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은 그 뒤 언론의 소명이 되었고요.

권력은 언론이 당연히 불편했었을 겁니다. 친구 사이에도 자신을 비판하면 기분이 상하는 법인데 국가의 최고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했겠죠. 그래서 더욱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정치인이라면 특히 더 그럴 겁니다.

함희수(이화여대 광홍 4): 동의합니다. 언론을 권력에 봉사하게끔 만들고 싶은 욕망은 전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 전두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지배해서 통제하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독재 권력은 점점 민심과 멀어지게 되어 파국을 맞게 되죠.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의 말로가 비참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권력이 언론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제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비(이화여대 방송 3): 깊이 동의합니다. 오늘날의 프랑스 언론에서는 권력에 대한 아부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시민 사회가 탄탄해졌고, 언론이 투쟁을 통해 '자유'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권력과 부단히 긴장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 언론 매체, 르몽드 신문사

이슬(이화여대 방송 4): 하지만 저는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해서 언론의 독립성이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경제 권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언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은 여전히 특히 '광고'라는 경제권력으로부터 크게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프랑스 언론 관련하여 얘기를 덧붙이자면, 르 몽드는 언론의 독립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프랑스의 유명 신문 매체인데,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신문 모델을 만듦으로써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언론의 선동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르 몽드는 특별한 신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함희수(이화여대 광홍 4): 저도 르 몽드 신문을 전공 수업시간에 들어 본적이 있었는데 르 몽드라는

프랑스 신문을 보며 언론을 비판할 수 있는 프랑스의 언론 상황, 그리고 신문에 대하여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부러웠습니다.

김현성(이화여대 방송 4):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의 선동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대한민국 언론 현실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하여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임소현(이화여대 작곡 3): '언론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감시견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이 있습니다. 얼굴 하나는 부단히 사회를 감시하며 짖어야 하고, 또 하나의 얼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감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은 밖으로 사회를 비추고 안으로 자신을 반성할 때라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언론은 스스로를 비판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발행 부수 약 200 만부가 넘는 거대 신문사가 세 개나 있고 일등 신문에 대한 안티 운동도 있지만 정작 일등 신문 자신은 어떠한 자기반성도 없는 것 같아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슬(이화여대 방송 4): 견제장치가 없는 언론에 유일하게 비판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언론학자들입니다. 언론학은 언론을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배우거나 가르침의 본분은 실천을 통해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마땅히 왜곡하는 언론을 비판하는 실천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헌데 대부분의 대학은 신문방송학과가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언론의 역사와 기능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이 입만 열면 먼 옛날 이스라엘 역사나 반복하듯이 언론학자들도 교과서적인 언론학개설로 수업을 합니다.

나폴레옹 침략군이 예나 시가지를 점령 할 때도 ‘정신현상학’강의만 했다는 헤겔처럼 우리 학자들은 언론이 탈선하고 타락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언론학개론’과 같은 이론 강의만을 고집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미래의 언론학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과거 이론에서 벗어나 현 시대의 언론현장에 직접 부딧혀, 온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희수(이화여대 광홍 4): 언론에 대한 비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언론의 생명과 존재 이유는 비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이 살아있으면 권력도 독재화하지 못하고 사회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부패와 타락 기준이 비판의 유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KBS 와 MBC 의 비판 없는 어용보도의 대가는 참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소위 ‘기레기’(기자+쓰레기)와 ‘엠병신’ 수준으로 국민들의 버림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정론지'보다는 '찌라시'의 시대이고, '저널리스트'라기보다는 '기레기(기자+쓰레기)'가 판을 치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죠.

이단비(이화여대 방송 3): 저는 손석희, 김소현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 뉴스제작 포맷을 적극 활성화시켜, 지상파 관련 모든 언론사들이 이러한 뉴스보도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TBC 뉴스룸’은 9 월 22 일(월)부터 저녁 8 시부터 9 시 40 분까지 100 분 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뉴스에서 저녁 메인 뉴스가 100 분 동안 편성된 것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고 주목을 끌었었죠. 특히 멋진 카피는 〈JTBC 뉴스룸에서는 진실이 뉴스가 됩니다〉라는 말인데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대한민국 언론 현실이 이 말을 새삼 공감, 지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의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희생됐던 보다 다양한 뉴스들을 함께 담아내겠다는 전략이며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가치에서 상대적으로 밀려 편집당하거나 삭제됐던 기사들까지 살리겠다는 뜻에서 훨씬 소외된 곳의 뉴스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기사들을 발굴하고 대중에게 의제를 설정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클릭 수 많은 기사만 베껴쓰고 따라하는 것이 트렌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8 시대는 그 날의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9 시대는 인터뷰, 심층취재, 토론 등의 내용의 구성은 손석희의 매력인 MBC 때 100 분 토론식의 느낌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고 뉴스의 깊이를 더욱 심도있게 다루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의 3 대 방송사도 이와 같은 포맷으로 뉴스의 보도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뉴스의 본질이며, 공정한 언론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소현(이화여대 작곡 3): 저는 언론기관을 견제하는데 있어 2030 세대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깨어진 대학생 및 청년이 중심이 되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건이나 정보들을 대학생들이 직접 취재도 하며 객관적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언론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대학별로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취재하여 하나의 언론기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선동적 언론에 굴복하지 않으며 국가적 진실을 지킬 수 있고 국민들도 그만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성(이화여대 방송 4):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오직 시류와 선정성에만 몰두하여 여론몰이 하는 현재 한국의 언론행태들을 살펴보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언론의 선동은 국민들의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만들며 정치적, 경제적 권력과의 유착 속에서 언론이 진정한 본연의 기능을 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모두 동의하며, 이는 더욱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 높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언론 스스로가 자기를 감시, 비판하며 반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각 대학교마다의 신문방송학과 커리큘럼 변화에 대한 필요성, JTBC 뉴스룸과 같은 포맷의 뉴스 제작 활성화, 대학생 및 청년들이 중심이 된 언론기관의 출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악의적인 언론의 선동이 소멸되는 날이 빨리 오길 희망하며 토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2, 그림 3 - 유투브 캡쳐



10월 7일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제 2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손민지(이화교육 3) :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정치, 사회분야의 과제와 대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미리 전달했다시피 지난 9 월 25 일에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재)한국선진화포럼 88 차 월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시스템의 기능부전 문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많은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극화, 일자리 3 불(부족, 불만, 불안), 소모적 갈등과 가치 전도된 경쟁, 최악의 출산율과 자살률 등은 수명이 다한 이 시스템들이 제대로 혁파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스템의 문제들 중에서도, 청년들에게 가장 개선이 시급한 공공시스템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임소리(이화교육 3) :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는 교육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대학입시문제를 차치하고서 보자면, 교육시스템 중에서도 등록금 문제가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화제일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 번째로 비쌉니다. 이러한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한 연체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통계에 따르면 2008 년도 4 만여 명이던 연체자 수는 2013 년도 말 7 만 8 천여 명을 돌파하며 약 2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체 금액 또한 2008 년 기준 1759 억 원에서 약 4000 억 원으로 2.5 배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이자를 갚는 것과 더불어 학자금 원금을 상환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버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민지(이화교육 3) : 저도 임소리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물론 높은 등록금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금 액수만큼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면 저는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원 1 인당 학생의 수는 32.7 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5.8 명의 2 배에 달하며, 도서관 평균 장서 수는 56 만 권으로 북미지역 442 만 권의 1/8 에 해당합니다. 높은 등록금에 달하는 교육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학생들의 요구로 국가장학금이 확충되고 국가근로장학금의 시급도 높아졌지만 저는 이것이 미봉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장학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국가장학금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공공시스템에 필요한 금액을 줄였을 테니까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대학의 재정을 투명화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아(이화교육 3) : 교육시스템의 문제는 고용노동시스템과도 연결되죠. 고용노동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비마련을 위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서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2012 년 대학내일 20 대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10 명 중 8 명은 고용주의 횡포나 착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78%가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체불을 시작으로 폭언, 협박, 성희롱 등 부당대우도 가지각색이고, 부당한 연장근무를 겪기도 하죠. 하지만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해 대처할 방법을 잘 모르고 더군다나 학비마련이 절실하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높은 등록금으로 부담을 겪는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감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정민지 학우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국가근로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나 교외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제도인데,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업체험을 통한 현장적응력과 취업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2014-1 학기부터 시급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을 확충해 학생들이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도중 고용주의 횡포나 착취 등을 경험한다.

손민지(이화교육 3) : 정민지 학우와 정윤아 학우가 말씀하신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제도에 대해 덧붙이자면,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많은 장학제도와 학자금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대통령 과학 장학금, 이공계/인문사회계 국가장학금,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드림장학금 등 장학금 제도가 많이 있죠.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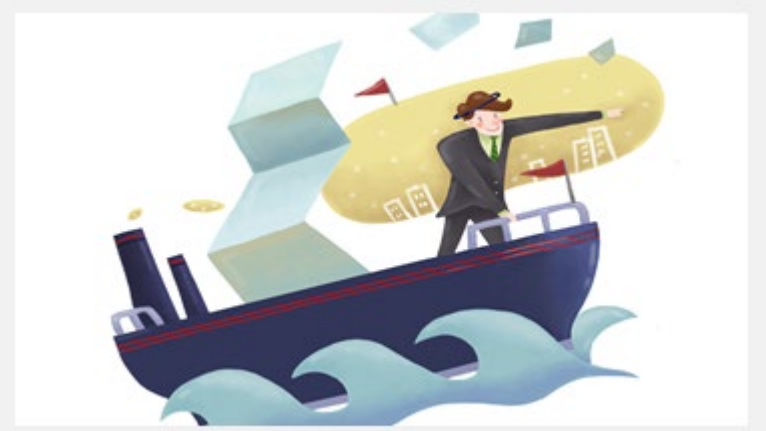
이현아(이화교육 3) : 저는 고용노동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죠.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문제 만큼 취업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일자리부족을 두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학생들이 콧대가 높아 대기업에만 몰린다' 등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대학진학률이 80%가 넘고 고학력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사람에게 단순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국가적으로 낭비일 테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창업을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 기성세대들을 보며 대기업이 평생직장이 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안정된 직장은 점차적으로 적어지고 있죠. 한남대는 최근 '2014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Play&Talk'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는 한남스타벤터 창업경진대회 시상식과 창업에 성공한 CEO 초청특강으로 꾸며졌는데요.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열기를 확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중부대학교의 경우에도 최근 충남도교육청과 충청권대학교 LINC 사업단과 함께 지역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창의인재 양성을 골자로 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충청권 8 개 대학들이 충남도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창업문화 확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 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죠.

대기업 주도로 경제발전을 해 온 한국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탄탄한 중소기업과 혁신적인 벤처기업입니다. 청년들의 창업은 그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독려해야 한다.

허슬이(이화교육 3) : 위 교육시스템이나 고용노동시스템 모두, 시스템 관련 체제를 구성하고 그 법을 만드는 정치권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이 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취업난 때문에 스펙을 쌓기 바쁘고 사람들 사이에서 연예 관련 뉴스들이 더 많은 화제가 되겠지만,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정치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럼이나 세미나, 동아리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청년들은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나아가 정치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청년들의 의견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투표를 많이 해야겠죠.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요.

따라서 청년들의 요구가 반영된 입법이 이루어지고 공공시스템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며, 꼭 투표를 해야 합니다.

손민지(이화교육 3) : 네,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공공시스템의 기능부전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시스템 중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시스템과 고용노동시스템, 그리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지적과 대안이 논의되었는데요. 우선 교육시스템에서는 높은 등록금 문제가 청년들에게 큰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가장학금제도도 좋지만 대학의 제정을 투명화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많은 장학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를 대학생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한국장학재단에는 다양한 장학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가 존재합니다. 장학재단에서도 장학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학비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은 고용노동시스템에서도 문제를 겪는데요. 임금체불, 폭언, 근로연장 등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를 겪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부당 고용주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일자리부족문제와 취업난 문제에 대해서는, 대졸자들이 넘쳐나는 현재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청년 창업을 권장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예컨대 한남대와 중부대가 인근 대학 및 지역 교육청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을 맺는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공공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청년들의 요구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많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공공시스템 중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의해보았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공공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고 나아가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열성적으로 토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1. http://www.youtube.com/watch?v=olNPsBZbQaw
2. http://www.youtube.com/watch?v=_ylWekQa9xg

④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10월 8일 숭실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제 2차 선진화 연구모임

김초아(숭실대 행정 3) : 지금부터 숭실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연구모임보다 많은 학우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세월호 사건 등 특히 올해는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출범 5 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무능력한 '식물 국회'라는 비난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위기에 빠진 한국 정치, 특히 논란의 중심인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우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숭실대 경제 3) : 우선 '국회 선진화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2012 년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을 필두로 발의되었으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 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법입니다. 또한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반수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5 분의 2 인 40%가 반대를 하면 법안 자체가 처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무력화시켰다며 악법이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법 자체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진화법을 적용하기에 아직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라고 봅니다. 과연 법이 선진화된다고 해서 국회도 선진화될까요? 선진화된 법을 시행할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의식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선진화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시행하기엔 아직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만길 (숭실대 경제 3) :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동의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이유는 우리 국회가 폭력국회 등의 오명을 벗고 좀 더 선진화되고자 함이었는데, 이로 인해 국정운영이 마비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지보다는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김월토 (숭실대 경제 3) :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데, 소수 정당에 발목 잡혀서 국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헌법 49 조 다수결의 원칙에도 위반이 되기도 하고, 야당 쪽에서 조금만 반대를 해도 아예 법이 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5 분의 3 이라는 기준을 완화시키던지 해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선미 (숭실대 유기신소재공학 3) : 저도 김월토 학우님의 의견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60%가 찬성을 한다해도 40%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어렵다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식물 국회' 논란의 중심인 국회선진화법

황수정 (숭실대 행정 4) : 저는 국회선진화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니까 재적의원 5 분의 2 가 반대하면 법안 자체도 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여당의 존재 자체가 의미 없지 않을까요?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이 힘 자체를 못쓰니까요. 우리나라 법체계도 여당에 맞춰져있으므로 국회선진화법은 시행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제'라고 상임위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이 쟁점 법안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가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 일 동안 논의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데, 사실 재적의원 3 분의 1 은 소수입니다. 이는 '소수당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은 취지 자체는 좋으나 이 법이 잘 운영되려면 여야의 건전한 토론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야를 보았을 때는 여야 서로 만족할 때까지 토론한 후 합의하여 법안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올리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안좋은 모습을 많이 보았잖아요. 따라서 법을 시행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이고, 이럴바엔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준 (숭실대 경제 3) : 저도 동의합니다. 5 개월이 되도록 법안이 한 건도 통과가 되지 못했다면 이 법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국회선진화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장만길 (숭실대 경제 3) : 저는 반대합니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굉장히 말이 많았고,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전 뒤집기 식으로 '문제가 되니 법을 아예 없애자'라는 것은 선진화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 분의 3 이라는 기준을 완화하거나 법 시행 보류처리를 하는 등의 개정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수환 (숭실대 경제 3) : 하지만 애초에 국회선진화법을 추진한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표면적으로는 폭력국회를 벗어나 선진화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상 당시 총선에서 여당보다 야당이 우세할 것 같으니 이 법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요. 이 법 자체가 모순과 모순이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언제든 국회선진화법을 가지고 서로 브레이크를 걸고 필요 이상의 논쟁이 지속될 수 있는데, 차라리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김초아(숭실대 행정 3) : 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자체의 취지는 좋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적용되기엔 우리나라 정치적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온 것 같네요.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개정하자 vs 폐지하자로 의견이 양분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법 자체가 아무리 선진화되었다 하더라도 매번 싸움을 일삼는 국회와,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있는 정치적 분위기라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김월토 (숭실대 경제 3) :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득권층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학생이니 만큼 어떻게하면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영 (숭실대 경영 2) :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투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엔 'SNS 투표 인증샷' 등을 통해 투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20 대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투표율이 생각보다 정말 낮더라고요.

아마 정치는 어렵고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썰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연예인들이 나와 정치적 주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정치가 그렇게 딱딱한 것만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고 있고…. 이처럼 예능 토크쇼에서 시사를 다루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도 너무 부담갖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만길 (숭실대 경제 3) : 아까 잠깐 SNS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청년들에게는 TV 보다도 인터넷이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의 역할이 클텐데요, 이는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문제는 근거없는 허위적 내용 등이 너무나도 많아 통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잘만 이용하면 정말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문가들이 정치적 의견을 올리는 것보다, 정치 관련 각 연구소들의 관리 하에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정치적 내용들을 SNS 등을 통해 많이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파급효과를 살리되 최대한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황수정 (숭실대 행정 4) : 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 바로 '정치축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실제로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일주일 정도 정치축제가 이뤄지는데, 말 그대로 '축제'의 의미여서 학교 축제때 부스 만들어서 축제하듯이 대학생들이 알아서 법안을 만들고 팜플랫을 만들고 사탕 같은 것도 돌리며 이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청년들의 의견에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다보니까, 그 중 지지를 많이 받은 아이디어는 실제 법안으로 채택되는 등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기득권층이 아닌 청년으로부터의 진정한 '정치축제'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대학생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할 제대로된 당도 없기에 아마 인터넷 기사나 SNS 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정치축제 비슷한 것을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서는 공무원들이 데스크에 쭉 있어서 정치적 의견을 받는 형태더라고요, 청년들로부터 우러나온 진정한 '정치축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웨덴의 정치축제 알메달렌(Almedalen)

지정근 (숭실대 경제 3) : 맞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부족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는 정치적 과도기에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기득권층들은 '모' 아니면 '도' 형태로 좌우 대립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고가 유연한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그러다 보면 단기적 성과는 어렵더라도 우리 세대 또는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김윤선 (숭실대 경영 3) :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고등 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이라 배우지 못한 학생들도 많고, 폭넓게라도 정치는 어떤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 지루하거나 무거우면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향으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초아(숭실대 행정 3) :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이번 토론에 대해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논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진화되지 못한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 지적해주셨고,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폐지하자' 또는 '개정하자'로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개정하자는 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네요.

두 번째 주제는 대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역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사 예능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 연구소 차원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한 SNS 홍보 활동, 청년층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정치축제 활성화, 정치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하는 교육의 중요성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토론이라 어렵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정치 참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연구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⑤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제2차 한양대 선진화 연구모임이 열렸다

김태준 :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벼랑 끝에 놓인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난 9 월 25 일에 한국선진화포럼에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치·사회와 관련된 위기의 내용을 토론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청년층에게 필요한 공공 시스템과 청년층의 정치참여 유도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명성 : 네 우선 청년층에게 필요한 공공 시스템으로 취업 안정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공 시스템이란 국민의 생활상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4 학년인 만큼 취업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고민인데요. 취업이 단순히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윤성 :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의 취업난은 역대 최악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공계에 비해 인문계 학생의 취업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과연 이것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낭비이기에 정부에서 이를 시정하는 측면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업과 관련해서 무조건 정부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성 : 네 저도 이에 대해 무조건 정부에서 전임해서 취업을 알선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저희 과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너나 할 것 없이 고시나 로스쿨로의 진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보면 그 만큼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시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취업을 회피하게끔 만드는 사회 현상을 없애야 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취업과 관련된 공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점점 고용을 줄이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일종의 시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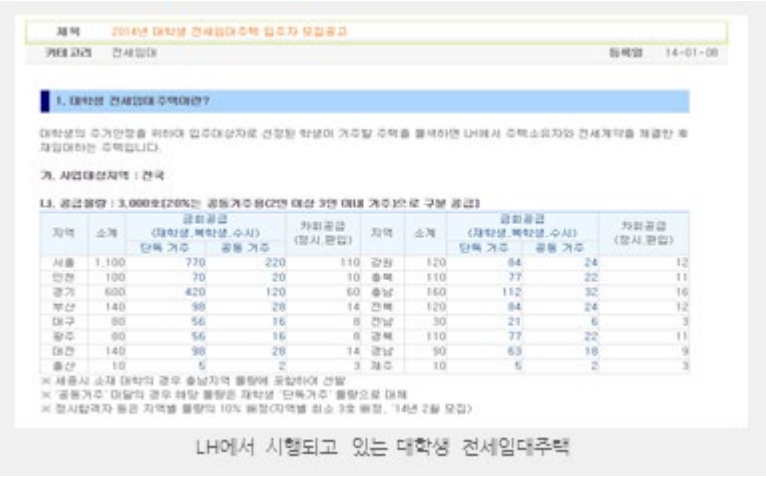
김영 : 그런데 정부에서의 시정자 역할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부의 역할은 노동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섣부른 개입을 했다가 오히려 해를 입은 사례가 많습니다.

일례로 지난 10 월 1 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소위 '단통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통신 단말기 시장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나친 보조금 경쟁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경색되었다는 점은 그 만큼 정부의 개입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준 : 너무 취업과 관련된 공공시스템으로 한정지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다른 공공 시스템은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김성구 : 청년층의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학생으로 한정지었을 때, 전부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취나 하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십리를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의 규모나 월세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5~6 평 남짓한 방에 보증금 1000 만 원에 월세 50 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 저도 그 말에는 공감합니다. 저도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매월 거주로 느끼는 압박은 상당합니다. 특히 1~2 평 되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제외하더라도 40 만 원 금액이 빠져 나갑니다. 정부가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폭리를 취하려는 업주를 감시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LH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서영준 : 현재 LH 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을 시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주택을 물색하면 LH 에서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전세 보증금 기준 7500 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지원을 해줌으로써 대학생의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의 주거복지 문제도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해결책이 있음에도 이를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경환 : 방금 말씀하신 것이 약간 위험한 것이 사실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수가 너무 작다는 점이나 대학가 인근에서 순수전세주택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 주택 소유자가 제도를 기피한다는 점, 이면계약문제가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저는 이에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분명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좋은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빈약한 홍보와 더불어 위의 문제가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면계약을 감시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주택 소유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수준은 매우 높다

김태준 : 청년층을 위한 공공 시스템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져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참여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수성 :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미비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한 편으로 청년층이 오히려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중인 청년층은 대부분 진보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적인 정치관을 지닌 청년층의 생각은 쉽게 묵살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성 : 물론 진보계열 청년층이 정치참여가 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달리 말해서 보수적 정치관을 지닌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분위기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수성 :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정치이야기를 할 때 진보적 정치관을 가진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보수적인 정치관을 지닌 것이 죄인 것처럼 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건전한 진보와 건전한 보수

양쪽의 세력이 필요합니다만 청년층의 경우에는 그 균형이라는 것이 무너진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최경환 : 저는 정치참여의 분위기 외에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블로그에 올린 칼럼을 보았는데, 거기서 청년을 위한 정당을 설치하거나 청년을 위한 언론사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의견이었는데요.

저는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서 청년층을 무조건 할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그만큼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 정치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 : 저 역시 거기에 동의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정치인이 현재 없는 것이 오늘날 청년을 위한 공공 시스템의 부재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앞서서 이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다만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비례대표제가 마치 오디션처럼 진행된다는 측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칫 당의 목소리만 내는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는 사실 비례대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이상 당에 속박됩니다. 탈당을 하고 싶어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 소신발언이라도 하게 되면 다음번 공천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차라리 지역구 공천을 통해서 청년 정치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윤성 : 다만 기존에 이득을 얻고 있는 정치인 쪽에서 비례대표 후보나 공천으로 청년층을 신경 쓸 것인가 의문입니다. 현재 기득권 세력에서 새로운 세력의 유입을 가장 경계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청년층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비례대표나 공천 등등이 실효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김성구 : 그런데 한 편으로는 점차 그 실효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자에 대해서 청년층이 가장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그 힘을 모두가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기존의 정당에서는 청년층을 잡아야 하는 것이 특명이 되었으리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태준 : 이때까지 저희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시스템과 청년층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공공시스템으로서 취업 안정망과 주거복지가 나왔으며, 청년층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으로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 공천자로 청년층을 일정부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청년층을 위한 정당이나 언론사의 설립 의견도 제기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년층을 위한 공공 시스템의 확립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주체가 청년층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지 출처

1. http://myhome.lh.or.kr/notice/announce/recruit_detail.asp?seq=21108&page=1&strSearchType=&strSearchString=&pubYear=&pubMonth=&bran_code=&notice_type=apt&supp_Code=01

2. http://www.youtube.com/watch?v=BEQsxIW8nPU

⑥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경희대 경영학과생들의 "한국 선진화 방안 논의!"

류호영(경희대 경영 3): 지금부터 경희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불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9 월 25 일(목) 한국선진화포럼은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정치·사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경희대 학생들도 한데 모여 대학생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의 핵심 주제는 '야당과 여당의 문제점을 보고 개선방안을 이야기해보자.'입니다.

기예진(경희대 경영 1): 대한민국은 내·외부적으로나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정치권은 대립과 분열을 막고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전략을 마련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가요? 그것보다는 당리당략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고, 오히려 대립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트러블메이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는 대학교보다 더 준엄해야 할 공간이다

오승택(경희대 경영 1): 제가 어렸을 적에 정치인들의 언어적.신체적 난투극이 나오는 TV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리 싸울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여야

간 대치 상태가 국회 폭력사태로 비화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참 변한 것이 없네.'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은혜(경희대 경영 2): 요새에는 좀 덜한 것 같지만, 국회에서 아무리 난장판을 쳐도 국민들은 "어휴-쟤들 또 저러네."라며 한심과 함께 한숨을 내뱉습니다. 요새는 국회 대신에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 앞에서 난장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주먹'과 '억지'로 정치를 해나갈 건가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 대학화(大學化)'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대학에서는 독서토론, 시사토론 등의 토론 동아리들이 많고 모의국회, 모의법정, 모의 UN 회의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수많은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보면 주먹과 억지로 상대를 납득시키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토론과 회의의 의미를 검색해보았는데,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하여 각각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이다. 회의는 "2 명 이상의 다수인이 모여서 어떤 안건을 의논 ·교섭하는 행위. 회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 면밀한 사전 준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회의 규칙에 따른 원만한 운영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채원(경희대 경영 1): 그 말씀에 따르자면,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토론'과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군요. 국회의원들은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를 하나요? 그리고 의논과 교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준비와 적극 협조'하고 '원만한 운영'을 돕나요?

이은혜(경희대 경영 2):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을 '학점'으로 평가하듯,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을 '국점'과 같은 평가지표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대학생들처럼 '국회에서 발표하고, 열심히 준비한 상태로 토론에 참석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회의에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점'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점'이지요? 교실에서 몸싸움이나 격앙된 말싸움을 하면 혼나죠? 수업에 참석 안 하거나 지각하면 점수 깎입니다. 반장이나 교수님 말 안 들으면 감점됩니다. 숙제 제대로 준비 안 해오거나 발표 망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국점'에 신경을 쓰도록 하면 어떨까요?



윤현수(경희대 경영 2): 좋은 의견이네요. 그들의 다툼도 문제지만, 야당과 여당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이 없습니다. 그 기본은 바로 '신념'입니다. 저는 야당보다 더 굳은 신념을 가져야 하는 여당 정치인들을 꼬집고 싶습니다. 여당 정치인들은 지금 '신념의 결여'라는 중증에 걸렸습니다. 여당 소속 정치인들을 보면 국민의 지지와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야당이나 종북좌파의 선동과 억지에 끌려 다닙니다. 역사적 책임감이나 애국심으로 무장된 신념이 없기 때문에, 갈대처럼 바람에 마구 흔들리는 것이지요.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는 '이론화된 신념'은 여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만 합니다.

류호영(경희대 경영 3):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인들에겐 커다란 책임감도 굳은 신념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에게 '신념을 심어주는 방안'을 고민해보았습니다.

경제학자이건 정책학자이건 생물학자이건, 자신이 가진 논리와 지식과 신념이 있다면 이를 꼭 '글'에 녹여내고자 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당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핵심적인 이유는 자본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책"으로 풀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절대왕정을 창출하고 죽을 때까지 절대권력을 누렸던 쥘 마자랭은『이기는 자의 조건』이라는 정치교과서를,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군주론』을 썼습니다. 그들의 책을 보면 그들의 사상과 정치이념, 신념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 단순한 몇 가지 정보로는 그 사람의 신념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저 정치인이 정말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인지, 국가 발전에 열의를 가진 사람인지, 통일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인지, 자유민주주의나 헌법수호에 대한 신념이 있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인이 아담 스미스, 쥘 마자랭, 마키아벨리들처럼 "책"을 쓴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생각을, 우리는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신념어린 책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훌륭한 국회의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신념에 관한 책을 출판해야만 하게끔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들이 쓴 책은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의 교과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책을 보고, 그들의 공약집을 보듯, 그들의 신념을 평가하게 됩니다. 후대 정치인이 될 사람들은 그들의 책을 보고 자신의 신념을 심판해보거나 발전시키거나 수정해보는 계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학자나 정책연구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외국에게도 좋은 사례와 연구대상으로 비추어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채원(경희대 경영 1): 저 또한 이에 공감이 갑니다.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의 7 시간의 미스터리'를 비롯한 여러 이슈들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해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면, 여당과 청와대의 일처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만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정치를 뒷받침하는 두 기둥이 야당과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구조를 만들고 운용하는 이 두 주체에 대한 문제해결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의 자유, 그 뒤에는 책임이 따른다

오승택(경희대 경영 1):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주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정치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은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언론사는 확실.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추정이나 잘못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동시에 분별력을 파괴하고 정치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기예진(경희대 경영 1): 기자들의 능력에도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한 국제단체가 세계 탄소배출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고 칩시다. 주요 일간지부터 인터넷 매체까지 그에 대한 기사를 마구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기사들의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마치 서로 베낀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그 기사를 썼을 때 과연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보고 썼을까?하는 의심이 듭니다.

게다가 그냥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단순히 보고만 할 뿐, 이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 왜 순위가 높거나 낮은지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발전과 개선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 지 논의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진정한 기사가 맞을까요? 심지어는 정상적인 한국어 구사도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넷 뉴스들을 보면 심히 현실적으로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요즘엔 언론 전체가 좌파든 우파든 그런 구별 없이,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에 집중하는 듯 합니다. 언론인들에게는 '글쓰기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 경영진이 영업사원들을 평가할 때, 고객만족도나 신규고객가입수 등의 특정 성과지표를 사용해서 그들을 평가하듯 언론도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를 평가하는 사람은 영업사원의 고객으로 비유될 수 있는 '국민'입니다. 굳이 제가 이름을 짓자면, Korea Press Satisfaction Index(KPSI)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언론인들은, 자유 뒤에 책임을 인식하고 있나요? 정신적인 책임감이 없다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그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요?

류호영(경희대 경영 3):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 가진 염려와 개선방안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온 개선방안으로는 3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회의 대학화로, 학점을 부과하는 방안, 둘째는 국회의원의 신념을 담은 책 출판의 의무화, 셋째는 한국언론만족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소소한 아이디어들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⑦ 동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동국대학교 2차 연구모임이 열렸다.

송동근(동국호텔 1) : 지금부터 동국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정치, 사회 분야의 선진화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전달했다시피 지난 9 월 25 일에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재)한국선진화포럼 88 차 월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데요.

오늘은 그의 방안으로 우리 청년들 즉, 대학생들이 느끼는 정치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현실은 어떠하며 해결방안으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허신양(동국행정경찰 1) : 사전에 받은 자료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 자료를 읽고 난 후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니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정치계 자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닥친 이유가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치판이 너무 혼동이 크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너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치 의견을 발표했으면 그 말을 지키고 국민들이 따라오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국민의 눈치를 보며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정치를 살며시 바꾸며 국민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바꾸는 척만 할 뿐 본질적 문제는 바뀌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올바르고 신념 있는 정치를 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판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인물들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정치판은 이상한 흐름으로 흘러 이러한 문제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너무 해결방안만을 찾으려 하지 말고 왜 우리나라가 '벼랑 끝에 선 위기에 놓여 있는가.' 하는 본질적 문제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한빈(동국사회체육 1) : 허신양 학우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이 의견은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구요.

그렇지만, 이것이 저는 해결이 된다고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과 같이 유명한 속담을 예로 들 순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치계 만큼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실질적 방안의 구책이 시급한데요.

우리 대학생들이 지피지기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백전백승을 시행할 실질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투표(Vote)를 주장하고 싶은데요. 현재 많은 학생들이 선거의 날을 공휴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투표 하나쯤이야..'하는 마인드로 인한 비극이죠.

그렇지만 웃긴 건 투표도 안한 사람들이 뒷 말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뒤에서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대학생들이 몸소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정치계가 바뀌고 정치인들이 우리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앞에선 깨갱거리고 뒤에서 으르렁 거린다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말하고 싶습니다.

김승연(동국호텔경영 1) : 송한빈 학우의 신선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으로 투표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으니 저는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번 주장의 핵심으로 지난 월례토론회의 핵심이었던 '소통'에 대해 다시 한 번 말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본질적 사회의 문제가 '소통'의 부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지역 간 소통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사회 간 소통의 부재가 문제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회 간 소통을 막는 대표적인 예가 SNS 와 휴대폰입니다. 사회에 필요한 건 소통의 장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자신만의 소통의 벽을 만들어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남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여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진실 된 소통을 막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해결방안으로 과도한 SNS 의 늪과 스마트폰의 벽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NS, 스마트폰이 가져온 소통의 부재

이서희(동국고고미술 1) : 맞습니다. 저 또한 김승연 학우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김승연 학우의 생각과 내용면이 비슷하여 핵심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다루었던 소통을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았는데요.

스마트폰과 과도한 SNS 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매체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포함하여 요즘 젊은 학생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못살고 SNS 가 없으면 심심해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대학생들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말하겠습니다.

이렇듯 과도한 스마트폰 중독 상태를 우리들이 아무리 소리친다고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스마트폰 중독 캠페인과 스마트폰 중독 운동을 펼쳐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SNS 에 전파시켜 파장력을 높게 하는 것이지요. SNS 의 장점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역으로 해결할 수 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연현우(동국호텔경영 1) : 만약에 이러한 캠페인이 나타나고 어른들이 아닌 나와 같은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 운동을 한다면 저도 많은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해결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절제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우리부터, 아니 청년 대학생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비록 벼랑 끝에 위기 속에 있지만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크게 성장하여 선진화된 나라가 될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양준혁(동국영어 2) : 저는 어릴 적부터 바라는 정치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느끼는 정치판은 허신양 학우의 말대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부정부패의 늪에 빠졌고 대표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위해 양보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을 할 뿐이죠. 하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진실 된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국가와 국민을 아끼는 사람으로 싹 다 다시 뽑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기에 저는 지금 있는 진실된 사람만이라도 잡고 싶고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힘을 사용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비판적 사고면 근거 없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진실된 사람은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실 상 대한민국 국가와 정치계를 변화시킬 방법이고 벼랑 끝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구할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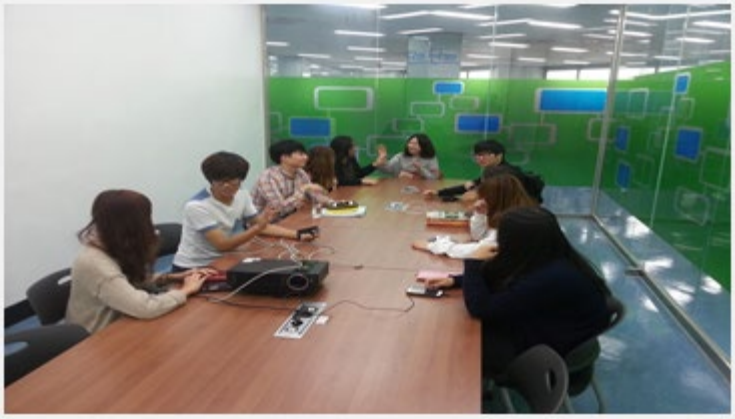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송동근(동국호텔경영 1) : 지금까지 저희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의 정치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이것을 해결할 방안과 구체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양하고 색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진실된 정치인을 찾아 우리가 힘이 되어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스마트폰과 SNS 등 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것들을 줄여보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사회 캠페인과 학생들의 운동이 나왔고요.

또한, 다른 의견들로는 우리나라의 정치계를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올바른 사상과 신념, 정명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우리 대학생들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안이 될 수 있다.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무척 공감되는 부분인'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목소리가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열성적으로 토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⑧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서경대학교 2차 선진화연구모임이 열렸다.

우동식 (서경대 경영 4): 지금부터 서경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정치, 사회 분야의 선진화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권정대(서경대 경영 2): 일전에 나누어 주신 자료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과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고 분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념적, 당파적 투쟁으로 인하여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늦어지고 통과되는 법안보다 그렇지 못한 법안들이 더욱 많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지금도 국회에는 통과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황예린(서경대 경영 3): 권정대 학우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20 대,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투표입니다.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일입니다만,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분노를 느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까? 잘못된 관행, 법안, 제도,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고 빠르며 정확하게 나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방선거를 보십시오. 전체투표율이 50 페센트를 간신히 넘겼고 지난 번 지방선거보다도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특히 20 대, 30 대 젊은 청년층의 투표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우리 대학생들이 먼저 깨닫고 투표를 적극 실천하는 자세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인혜(서경대 경영 3): 황예린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치인들은 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인은 자본에 의해 움직이고 자본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그러한 동기부여가 바로 '득표'일 것입니다. '누가 뽑혀도 똑같다.','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이러한 생각들을 대학생들부터 버려야 합니다.

지난 대선부터 해서 선거 공약들을 보면 유난히 복지공약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 표를 얻기 위해 주요 표밭을 공략하기 위해 그런 공약들을 내걸은거 아닙니까?

20 대의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정치인들은 20 대의 여론과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우리를 위한 공약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며 우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함은 물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경운(서경대 경영 4): 저도 정치참여에 관해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저서 'My Life'를 보면 클린턴은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난 뒤 정치에 큰 관심이 생겼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미국 대통령도 꿈꾸게 되었고 결국에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취업, 스펙의 문제에만 몰두하여 정치를 너무 등지고 서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그러한 환경을 만든 사회적 책임과 어른들의 과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에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을 갖는 문제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터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학우분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저는 신문을 읽을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신문은 취업이나 상식을 쌓기에도 좋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매체입니다. 요즘은 종이 신문 말고도 대학생들이 대부분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겨 앞으로 신문읽기 모임을 결성할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사회자님 어떠신가요?

우동식(서경대 경영 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신문읽기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제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읽기 모임과 함께 독서모임을 조성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김가연, 양수진, 서민주 학우들은 이미 저와 함께 경제, 경영에 관하여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는 학우들입니다. 향후 동참하실 분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더욱 발전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연(서경대 경영 1): 신문읽기의 중요성과 의도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사회자분께서는 현재 저를 비롯한 총 4 명의 경영학부 1 학년 학생들에게 전공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함께 하시고 친절하게 지도해주시는 멘토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멘토링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활동에서 전공을 비롯한 공부와 대외활동, 각종 수업관련 정보와 과제 등에 대해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와 함께 신문읽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제신문 읽기가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번 모임을 계기로 다른 신문들도 함께 읽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수진(서경대 경영 1):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함께 논의하는 활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주(서경대 경영 1): 저도 동의합니다.

우동식(서경대 경영 4):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모임의 결성과 발전에 관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준비해서 확장 및 확대, 발전시켜가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지민(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2): 저는 공공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공화정제국가로서 5 년마다 정부의 수반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5 년마다 정부와 정권이 바뀌면서 조직을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 때마다 오는 진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이명박정부시절의 행정안전부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뀌고 기능과 역할, 인원 등등에는 거의 바뀌는 것이 없는데 이럴거면 왜 바꾸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동사무소까지 이어져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주민생활과가 어느날 주민행정과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담당관의 이름도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다 행정의 낭비이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공시스템의 문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지나친 낭비와 행정력 소모는 비효율적이며 지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빠진 우리들의 자화상.

나은혜(서경대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1): 지금까지 정치적인 의견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부분의 선진화 방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몇 해 전부터 매년 나오고 있는 화두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소통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 정치인과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등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저는 스마트폰이 대학생과 젊은층을 차단시키는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 대화하는 법을 모르고 소통하는 법을 모르며 친구나 가족보다 스마트폰이 익숙해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학교를 오며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느꼈지만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승객들 모두가 앉아서 열심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어폰으로 귀를 닫고 스마트폰에 시선이 빼앗겨버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소통이 되고 남을 배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적인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서로의 대화를 단절하고 그것이 증폭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야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통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사회적인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들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만 듣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상황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만 쳐다본다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회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을 자제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원(서경대 경영 3):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사회의 불통을 야기하고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신선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과도하게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어린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절제력을 갖출 때까지 학교 수업시간만이라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인 저의 사촌동생의 경우 학교에서 아침에 휴대폰을 수거하고 집에 갈 때 돌려준다고 합니다. 현행의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예린(서경대 경영 4): 나은혜 학우와 안희원 학우의 의견을 듣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최경운 학우가 신문읽기 모임을 결성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맥락과 동일하게 스마트폰 자제운동이나 캠페인을 한 번 기획하고 제안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권정대(서경대 경영 2): 맞습니다. 기술의 진보도 좋지만 그것을 다루어야 하지 끌려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 있다면 저도 한 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열띤 토론을 하는 서경대학교 학생들.

우동식(서경대 경영 4): 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좋은 의견들은 우리나라를 선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분야에서는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관심을 평소에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문을 평소에 읽는 것이 좋겠고 신문읽기 모임을 결성하자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회분야에서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회적문제의 출발은 불통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통의 원흉인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을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⑨ 포항지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2차 선진화 연구모임

이희진(선린대 간호학 1): 지금부터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난 9 월 25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88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였던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대로, 대학생인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정치, 사회분야에서 더욱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 여야는 물론이고 선동언론의 문제까지 더해져 혼란스럽고 분열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더불어 저희와 같은 청년들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박신의(한동대 글로벌리더십 1): 시민들은 선거와 언론 또는 시민단체를 통해 의견을 표출합니다. 그 의견들을 정치리더들이 잘 반영해서 산출이 잘 되어 순환하는 모습을 띠면 좋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견이 표출되는데 정치계에서 묵살을 한다면 권위주의적 또는 독재적인 정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의견 투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정치의 주체측도 적극적으로 듣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핵심을 잃은 민주화의 부재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윤(한동대 글로벌리더십 1):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한데요. 청년들의 참여가 적은 이유는 정치의 형태와 원리,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과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정보를 알면서부터 관심은 생깁니다.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되지 않고 있고, 학생들 자체적으로도 알기를 거부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그 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능을 위하지만 결국 학생들이 개인의 지적 역량을 높인다는 태도를 갖고 능동적인 자율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입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교육자의 태도로 인해 학생들의 마음가짐은 바뀔 수 있을 텐데요, 대입이 학생의 전부가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고 교육을 위한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진(선린대 간호학 1):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청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컨텐츠와 교육적 요소가 함께 제공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나 예능 등 방송이 있는데요, 영화 '변호인'은 많은 정치적, 역사적 요소를 시사하여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는 멤버들의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 방송을 하며 지방선거를 광고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정치참여 방법과 원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뜨거운 감자이며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해 사람들이 색을 드러내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방송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게 문화적 컨텐츠와 교육적 요소가 함께 적절히 제공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의 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과 문화적 요소를 함께 사용하자

유명지(한동대 글로벌리더십 1): 저는 정규교육의 틀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 이상 젊은 층이 성인이 된다고 갑자기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제공을 적절히 하기 위해 방송은 물론 책이나 잡지 등 교육서적의 활용을 적극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포털사이트 백과사전에는 책에 나온 지식들이 발췌되거나 인용되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전자도서로 출간되거나 모바일어플로 정치참여나 시민단체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정치참여가 더욱 쉽고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진(한동대 글로벌리더십 1): 정치가 굉장히 어렵고 남에 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학교마다 학생회가 있고 학생들은 투표를 합니다.

자신들의 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직접 느끼고 인식하며 정치참여 태도를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회장 등 투표하여 선출된 리더십의 역할과 권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제도와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정치참여와 관심이 정치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희진(선린대 간호학 1): 다양한 의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의견들이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책을 고민한다는 것이 선진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 교사들이 형식적으로 제도권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성장을 위하는 교육적인 마인드를 갖고 교육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위해 문화적 컨텐츠와 교육적 요소를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우수서적을 활용하고 모바일 어플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 많아져 학생회나 학생단체등에서 활약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의 정치 참여가 스스로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⑩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명지대학교 방목학술관에서 이뤄진 제2차 선진화연구모임

조아라(명지디미 3) : 지금부터 명지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국내적으로 이념,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및 경제 질서가 큰 혼란을 겪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합니다.

이에 지난 9 월 25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정치·사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의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은 곧 언론의 선동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언론의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유로운 의견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진(명지디미 3) : 저는 미디어 학과에서 전공을 하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세월호 사건 전까지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다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실태를 알 수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모든 승객들이 구조됐다는 오보부터 시작해서 신분확인이 안된 가짜 잠수부를 뉴스에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대중과 정부 간의 갈등유발, 이후 세월호법을 둘러싼 유가족들 및 관계자에 대한 편파보도도 이뤄졌었죠.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보도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후에 오보를 사과하는 언론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점 우리사회에서 언론은 믿을만한 기관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기자직을 위해선 언론고시라고까지 불리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죠. 하지만 이렇게 뽑힌 기자들은 스펙면에서는 완벽할지 몰라도 기자가 지켜야 할 원칙과 가치에 대해서는 잊은 듯 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나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교실'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이나 국립외교원 같이 일정 수준의 언론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직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자윤리와 취재현장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현장에서 오류없는 기자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심 동(명지디미 2) : 저는 이유진 학생의 생각에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정부가 기자 50 만 명을 대상으로 기자 자격시험을 실시한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수준을 높일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사상테스트였습니다. 이 시험은 공산당 사상을 비롯해서 신문출판 규정과 언론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 측정했습니다. 이 자격시험에 떨어지면 3~5 년 안에 재시험 기회를 주고 그래도 떨어지면 기자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언론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약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언론사 각각에 기자윤리를 가르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취재해 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는 작업도 이뤄지는 직책도 새롭게 만들면 오보들이 줄 것 같습니다.

조아라(명지디미 3) : 네, 저는 심 동 학우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과거엔 언론사에 기자들이 취재해온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팩트체커(Fact Checker)라는 직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암묵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기자들에게 일임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직책이 다시 생겨나 객관성을 잃지 않는 언론이 돼야 한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진(명지디미 3) : 미리 나눠주신 자료에서도 정말 공감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현재 대학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 시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언론에 선동된 대학생들이 전단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7 시간이 아니라 제대로 인명구조가 안됐던 우리나라의 안전시스템에 있다는 지적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대립과 분열을 해결하기보다는 이해관계로 점철된 소비적인 논쟁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 이러한 쓸모없는 논쟁을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상을 그대로 보도하다가는 정말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의 여러 집단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들이 주요 매체로 전달되고 공론화되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논쟁으로 흘러버리기도 하죠. 미국에는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라는 블로그 뉴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블로그 뉴스가 우리사회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생각은 나누되, 이것이 공론화되기까지는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을 나누기에 블로그 뉴스라는 플랫폼은 아주 좋은 매개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숙의도 없이 기자와 언론사에 필터링된 기사들보다는 훨씬 심도있는 기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아라(명지디미 3)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짧게 요약해보자면, 기자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국가적 기관, 또는 언론사 내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취재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직책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셨고요. 우리사회에 새로운 언론의 형태로 소셜 저널리즘이 우리사회에 더욱 진지한 논의거리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현대사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해소의 주체! 한국사교과서, 교사, 학생!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현대사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진(명지디미 3) :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하던 야당 후보가 생각이 납니다. 과거 대통령의 출신을 친일이라며 매도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공정해야 할 TV 토론을 보면서 얼굴이 절로 찌푸려지더군요.

과거 어떤 국회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군사정권에 의한 집권 외에도 정통 친일파라는 출신 성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출신성분만 보자면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가려진 경제발전도 매도돼야 할까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편향된 시각은 공동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 순혈주의로 따지자면 김일성은 만점인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까지 내려오는 권력의 순혈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듯 역사적 인물에 대한 출신이나 과오 때문에 그 인물의 업적까지 가려진다면 우리는 반쪽 역사를 배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유진(명지디미 3) : 저도 박유진 학우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최근 불거진 유관순 열사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도 출신성분 때문에 열사의 업적이 폄하된다면 우리는 '역사는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테스트할 것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서 자신만의 역사관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과거 사실에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비로소 한국사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학생들에게 진정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역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역사가에 대해서부터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의 입장에서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집필가에 의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 동(명지디미 2) : 저는 대학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역사과목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암기형태로의 수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다 잊어버리고 말죠. 현실적으로 제 주위에만 봐도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유진 학우의 말대로 진정한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깊은 공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생각을 더해가야 합니다.

나눠주신 자료에서 나와있듯이, 헤겔의 정반합은 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과 반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도 귀기울여 듣고 새로운 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아라(명지디미 3) : 네,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리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역사적 이념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사 교과서가 중요하며 이를 가르치는 교사부터 학생까지 '역사'를 제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더불어 대학생 시절의 역사교육과 정반합으로 가는 성숙한 여론분위기의 형성에 대해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

오늘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의 언론과 역사적 이념대립에 대한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명지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소박하고 참신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른데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는 오늘 우리의 선진화 연구모임 토론에서부터 변화하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상으로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패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선진화 과제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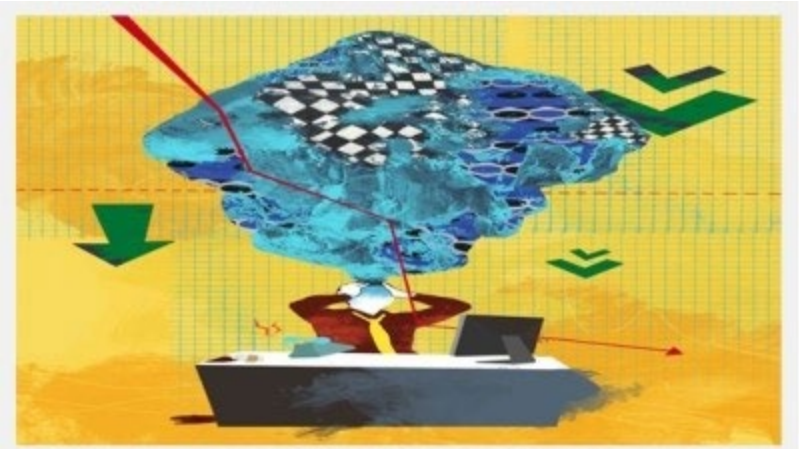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II)

- 경제, 복지 편 –

(제90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김초아(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등이 켜졌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수출 경쟁력 약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저성장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복지 수요는 끊임없이 급증하고 있어 재정건정성마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복지편- 을 주제로 하여 지난 11 월 20 일, 제 9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내부적 취약성, 세계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노출돼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려면 기업이 '야성적 본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이사는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선 기존 제도와 구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수요 급증에 대해 성장을 위한 복지산업을 육성하고 복지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복지예산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지적하며, 중장기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증세보다는 정부예산을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한 복지정책의 확충은 지자체의 복지 부담을 가중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무상' 복지에 대한 논쟁으로 떠들썩합니다. '모두에게 복지혜택 확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의 확대 또한 불가피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복지 재원으로 과연 모두에게, 얼마 만큼이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년 정부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지금, 정부는 경기침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15 년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5.7%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관련 재정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재정수입이 이에 비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과된 예산안은 곧 적자 재정으로 편성되어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예산 심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으로 인한 복지 예산을 각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늘어가는 복지 정책 만큼 지자체의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 디폴트'(지급불능) 선언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한계를 드러낸 가장 큰 원인은 정확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의 성급한 정책 추진과,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공약 남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채 무리한 복지 확충을 계속 해나간다면 무분별한 복지로 인해 경제가 무너진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에 무너진 아르헨티나 경제

20 세기 초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비옥한 땅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복지정책과 분배 우선의 나눠주기식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재정 적자는 쌓여만 갔고, 결국 2001 년에는 대외채무를 갚지 못하겠다며 모라토리엄(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등 완벽해 보였던 보편적 무상복지가 오히려 '국가 재정 파탄'과 '경제 몰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보편적 무상 복지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영국,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까지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선별적 복지'로 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대를 역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복지 지출이 훨씬 많은 나라들마저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편적 무상복지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자체의 복지 디폴트 선언은 앞으로의 불어 닥칠 재앙에 대한 일종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복지정책의 전제조건은 '지속 가능성'

무상복지. 당장은 혜택이 많아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용두사미(龍頭蛇尾)꼴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복지 체계는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성',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성급하고 무책임적인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멈추고,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계층부터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선별적 복지체계'를 통해 재정적 여유가 마련되는 대로 복지 대상과 제공범위를 늘려가는 식의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별적 복지체제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 재정건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건전한 복지 정책은 건강한 국가 재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 위기의 방패막 역할을 하는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로 반드시 회귀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탄탄한 재정과 적재적소에 투입되는 복지 정책의 조화로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② 김태준(한양대학교 정책학과)



현재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국에서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양적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위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외적으로 한국경제는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경쟁력 사이에서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0 년간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전자,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의 주요 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수출 애로와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장만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복지에 신경을 써달라는 국민적인 열망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위기가 정말로 어떠한지 궁금해서 지난 11 월 20 일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복지편- 제 90 차 월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다양한 토론자 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이 날 김종석 교수(홍익대 경영대학장),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이사, 김원식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님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상황이 위기라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대외의존도와 관련된 위기나 정치권의 리더쉽 부재 등을 말씀하셨지만 특히 복지정책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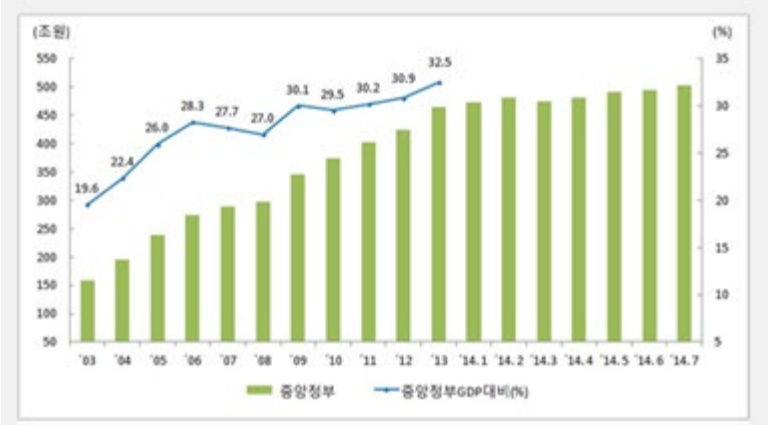
김용하 교수님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증세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지재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증세를 하게 된다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증세보다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원식 교수님은 포퓰리즘의 등장 가능성을 염려했습니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낮아지지 않으며 복지 만족도 역시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무상복지의 범위를 넓히자는 여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의 확대는 곧 증세를 의미한다고 하시면서 사회보장세 도입을 주장하셨습니다.

필자는 교수님들의 열띤 토론을 보면서 복지정책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세는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증세 없는 복지가 가장 좋은 방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지출 없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공짜로 점심을 먹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를 보았을 때, 증세 없는 복지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은 증가될 수 있으나 복지재원이 바닥난다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의 위험을 미래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2014 년 우리나라의 한 해 정부예산은 357.7 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복지, 보건, 고용 관련 비용이 105.9 조 원입니다. 이는 전체 분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현 정부에서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부채를 생각하면 복지를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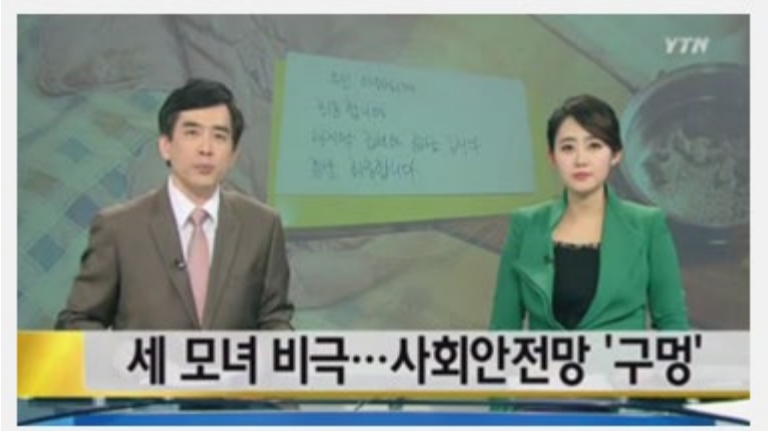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부채는 2014 년 7 월말 기준 503.3 조 원입니다. 2014 년 정부예산과 비교했을 때 이미 예산규모를 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았을 때 이미 우리나라의 재정은 건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다른 기준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있습니다. 2013 년 중앙정부부채는 당시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5%에 불과합니다. 이는 일본(218%)이나 미국(100%)와 비교해도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부채에서 자국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90%에 해당되기에 재정건정성은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살펴보면 매월 누적되는 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 년 4 월 이후로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는 2012 년 1 월, 2013 년 1 월, 2014 년 1 월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와 비금융 공기업의 채무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2012 년 기준으로 821.1 조 원입니다. 이는 당시 GDP 대비 59.6%로서 앞서 찾아본 32.5%의 수치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은 그리 좋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복지를 통해서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에 이는 단순한 지출이 아닌 투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부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사회안정망은 어떠한가?

저는 이에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의 반대급부가 복지는 아니지만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세금 부담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말은 아닐지라도 현재 20%대에 머물고 있는 부담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2 차, 3 차 사회안정망의 확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안정망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의 혜택을 받는 계층의 범위가 좁다는 것과 그 혜택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은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양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더욱 많이 확보한 후 좀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③ 김현성(이화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과)


미래가 불투명한 한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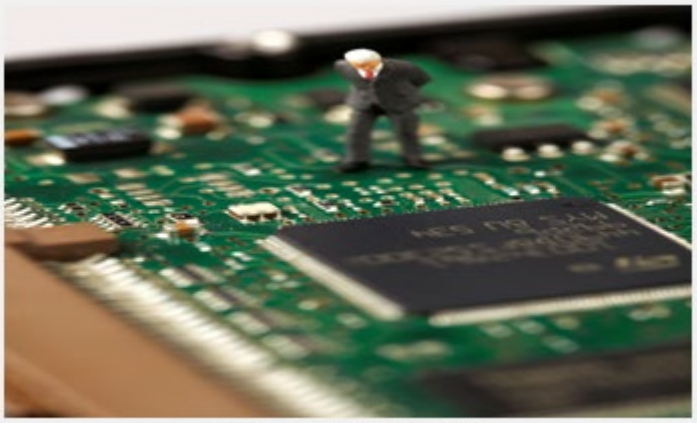
저성장 국면을 맞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현재 한국

경제의 미래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11 월 20 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복지편〉을 주제로 제 9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에서 해법과 대응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종석 교수(홍익대 경영대학장)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고착된 현 상황을 분석하여 이를 위해 선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 기회로 성장동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는 복지예산 논란에 있어 증세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정부예산을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김영수(조선비즈 대표이사) 토론자는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하며 국회가 국익을 위한 선택에 먼저 나서야 함을 요청했으며 김원식(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정핵의 방향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난이도가 매우 높은 복지정책과제가 폭주할 것을 우려하며, 본격적 복지정책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해답은 기술경쟁력

저는 이 네 분의 주장 중 특히 성장동력을 높여야 한다는 김종석 교수의 의견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혁신의 가치가 중요하며 이 중심에는 바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회사 다이슨의 맥스 콘체 최고경영자(CEO) 또한 "내부 환경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엔지니어보다 젊은 사람들은 바깥에서 보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슨이 원하는 혁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혁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젊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창의성은 혁신의 원천이라고 봅니다.



기술혁신의 주인공은 대학생

따라서 저는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 대학생들이 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교육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직접적인 현장 교육은 대학생들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직접 기업의 기술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또 다른 기술 혁신이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기존에 있던 대학생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학생을 일정 부분 기술적인 부분의 아이디어 회의나, 기업기술현장에 참여시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경우 취업이나 창업을 투자해주는 평가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대학생들은 젊음이라는 혁신의 원천과,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업의 현장교육을 통해서 나온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거나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혁신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들의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갖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은 밝지 않을까요?

④ 류호영(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작아지는 Medium-end-KOREA

최근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현상이 나타나자, 일본기업들은 뛰어난 기술에 가격경쟁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가 내 치열한 경쟁과 기술 따라잡기(catch-up)로 저렴한 가격뿐만이 아니라 기술경쟁력마저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진 대한민국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11 월 20 일에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복지편- 을 주제로 제 9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은 경제와 복지 분야의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자인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이사는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는 일본의 잃어버린 30 년과 같이 장기침체의 터널로 들어간 것과 같다'고 말하며, 국회가 정치공학 구조에 따른 선택이 아닌 '국익'을 위한 선택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주제발표자인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한국 경제의 특성인 '높은 대외의존도'를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해외수출에 주력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현재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라서 수출이 줄어들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김종석 교수님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 및 고용창출 잠재성이 큰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경제 각 분야에 내재된 각종 경직적 요소(제도, 규제)를 적절히 제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외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기본적인 구매력은 1 인당 소득뿐만이 아니라 인구수에서도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 천 만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커진다 한들 내수구매력은 오천 만이라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중국은 13 억, 인도는 12 억, 미국은 3 억, 일본은 1 억 3 천만 명입니다. 소득을 고려하여 부유한 OECD 국가들의 인구수만 살펴본다 해도, 12 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에서만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본을 공급받는다면, 약소국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FTA 와 같은 무역협정이나 '수출입'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게 더더욱 중요한 의미와 의의를 가집니다. 내수시장의 한계구매체감을 깨달은 대한민국에게는, 국가 간 국경과 무역장벽을 깨트려,

시장을 전 세계로 확장해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의존도를 높여야 살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대외활용도가 높아야 사는 나라, 대한민국

대부분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우리나라가 '외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대외의존도를 낮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역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며, 아무리 내수를 활성화하여 비중을 높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전 국회의원이신 조전혁 명지대학교 교수님은 '대외의존도가 아니라 대외활용도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존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활용이라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단어를 통해 관점을 바꿉시다.



위험을 분산하는 수출·자본 포트폴리오

금융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투자 상품과 자산들의 위험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투자 포트폴리오와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구성하곤 합니다. 흔히 위험분산의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제는 무역 수출시장, 해외자본시장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사용해야 합니다.

삼성이 만약 러시아에만 수출한다면, 러시아의 불경제에서는 꼼짝없이 매출급감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이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수출을 한다면, 한 국가의 경기침체에도 그나마 매출 감소에 덜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들, 국가마다 경제상황에는 차이가 있고, 투자자들마다 투자대상이나 투자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위험선호도도 다릅니다. 따라서 위험분산을 위해 최대한 많은 국가와 최대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 포트폴리오입니다.

결코 의존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외국을 받아들이고 개척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활용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강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활용도를 높입시다. 대외활용도를 높여, 세계를 휘잡고 세계 곳곳에 진출하고 세계로부터 자본을 공급받는 세계와 가까운, 세계가 되는 대한민국이 됩시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⑤ 박성찬(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제90차 월례토론회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경제,복지

가격경쟁력과 기술로 G2 에 진입한 중국, 오랜 경기불황에서 탈출하여 다시금 왕좌에 도전하는 일본,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녹록치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30 년을 이끈 주요 산업 역시도 세계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고 이를 극복치 못하면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자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복지를 주제로 제 9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님은 "최근 국내 주력 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는 상황은 경쟁력에 한계가 생긴 것"이라며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과 야성적 본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 완화, 규제 개혁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님은 2015 년 정부예산안 중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장기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에서는 증세보다는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김영수 조선경제 i 대표님은 우리 사회가 정체된 이유 중 하나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할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라며 과거의 삼성, 현대의 뒤를 이을 새로운 리더쉽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기존 제도와 구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혁명적인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수요 급증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된 상황에 대해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은 “성장을 위한 복지산업을 육성하고 복지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 분야의 상업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복지제도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리적인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름에 허덕이는 갈매기의 모습이 우리경제의 모습과 닮은 것 같다.

저는 그 중에서 김종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규제 개혁이 코마에 빠진 한국 경제를 깨어나게 할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대한민국은 각종 크고 작은 규제들로 범벅된 상태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리와 공평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였고 그 의도는 좋았지만 이는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느라 큰 것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여러 제약이 늘어나자 기업들은 모험적이고 야성적인 시도를 꺼리게 되었고 현상유지에 급급한 겁쟁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국가는 규제총량제나 규제일몰제 등을 도입하여 과도한 규제를 철회하고 급변하는 시장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후된 규제를 폐기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소극적인 접근 방법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에는 그 힘이 약했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기업들의 투자를 불러일으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과감히 철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자그마한 규제만 살짝살짝 건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잘라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984 년 스웨덴에서 도입한 길로틴(단두대)제가 반드시 확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두대에서 머리를 자르듯이 오래된 규제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빠른 시장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긴 논의 기간도 단축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합의도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 없고 어떤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반발은 극심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 단체라도 반대하면 그것을 달래느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여 정체되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실현하기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범정부차원의 규제관리기관의 설립입니다. 물론 지금도 각 지자체들이 규제개혁 T/F 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방향이 바뀌기에 5 년마다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와 같이 경제 정책적 문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곳 저곳 급한 곳만 메운 미봉책같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권의 교체에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중장기적인 국가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권은 그 특성을 위해 곁가지는 둘 수 있지만 그 중심이 되는 나무는 규제관리기관을 통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 정권교체기에 발생하는 레임덕으로 인한 경제위기관리능력 상실을 대비할 수 있으며 독립된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세계경제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험적이고 야성적인 기업의 표효가 들려오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다시금 발목에 걸려있던 족쇄를 풀고 달릴 수 있을 것이며 예전과 같이 야성적 본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부활은 침체되어 있는 경제 분위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규제개혁으로 인해 반기업적 정서가 생길 수 있지만 기업은 국민의 것을 빼앗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는 주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업마저 살릴 수 없다면 말마따나 길게 가면 우리는 전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쉽과 장기적인 국가적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규제관리기관의 도입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인 규제병을 치료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경기침체의 위험에서 벗어나 옛날과 같이 끓어오르는 경제 환경이 되기를 꿈꾸어봅니다.

⑥ 손민지(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고령인구를 근로인구로 전환하자.

저성장 국면을 맞은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20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9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이 위기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김종석 교수님은 기업 환경 개선과 세(稅) 부담 완화, 규제 개혁, 투자유인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공기업 개혁과 복지연금제도의 개혁을 주장했고, 김용하 교수님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증세보다 정부예산을 비용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대표이사님은 국회가 정치공학 구조에 따른 선택이 아닌 국익을 위한 선택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고, 김원식 교수님은 복지 이해관계자의 확대에 따라 난이도가 매우 높은 복지정책과제가 폭주할 것을 우려하며, 복지정책 중 하나로 고령화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저도 고령화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기퇴직과 청년실업으로 근로기간은 단축되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복지를 수혜받아야 하는 기간은 늘어나면서 복지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령자를 근로자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지비 지출은 지금보다 감소하고, 복지비 보유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말이죠.

한국보다 고령화가 보다 일찍 진행되었던 유럽선진국의 경우 고령인구를 근로인구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고령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죠. 영국에서는 연금수령 연령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경우 국민보험세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에서는 고령근로자의 업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장기적 교육의 가치를 홍보하고, 고령근로자에게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근무 시간에 유연성을 두는 등 고령자에게 친화적으로 근로여건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고령인구를 근로인구로 전환하는 외국 나라들

이렇듯 한국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 선진국들도 고령자들을 근로인구로 전환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한국의 노사발전재단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활용을 위해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많이 부족하죠.

한국도 위에서 살펴본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법적으로 고령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능력을 잃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고령근로자를 배려한 근로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령인구를 근로인구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확대되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고령인구의 소비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좁게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부터, 넓게는 한국 경제에 닥친 위기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⑦ 송동근(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제 90차 월례토론회,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우리의 한국경제는 일본의 기술 경쟁력과 중국의 가격 경쟁력 사이에서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자, 자동차, 철강과 같이 지난 30 여 년 간 우리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주요 산업의 기업들이 수출 애로와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우리의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들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법과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20 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9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선도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업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저성장시대에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함을 강조하며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조선경제 i 대표는 기존 경제, 복지 부문에서의 정치공학적 구조를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어 고령화에 대한 복지정책의 중요성과 투자를 언급하면서 본격적 복지정책은 바로 지금부터 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하 교수의 '저성장 속, 느리지만 지속가능한 국가모형 구축'방안에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숨고르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음의 도약을 위해 새 정비를 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증세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복지 확대,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하며 정부지출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복지확대 부분은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력을 중요시하기에 저성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성장의 늪 안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높은 성장을 위해 더욱 더 혁신적인 체제개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한국경제는 양적, 질적 성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경직적인 우리나라에서 유연한 복지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성장 속 숨고르기를 통해 선진화된 의식을 바로 세우고 비효율적 정치 제도와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여 효율적으로 만든다면 우리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으며 위기 속에 빠진 대한민국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⑧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과)



한국선진화포럼은 11 월 20 일 목요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복지편- 을 주제로 제 9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향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토론회였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김종석 홍익대 교수님은 저성장시대에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날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거울삼아 다가올 경제위험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셨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님은 복지예산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상을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증세보다는 정부예산을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이사는 한국경제가 일본의 경제 위기와 그 모습이 많이 닮아 있는 점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시었고 함께 참석한 대학생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님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시며 복지정책을 잘 다루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점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였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 90차 원레토론회

저는 무엇보다 복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분야를 선진화시키려면 공공분야에서도 형평성이 아니라 기업처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치분야에 대한 개혁으로 국회의원들의 세비절감과 소선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일 인 당 월급과 판공비 등을 합치면 연간 1 억 8 천여 만 원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경우 공무원들의 근검절약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낭비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구와 국토에 비하여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선구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한 자치구의 경우 두 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15 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반하여 지방 선거구의 경우 전체 주민이 1 만여 명 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소선구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선거를 치르느라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시기를 맞추고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교육감 선거 등등도 일정을 일원화하여 비용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줄이고 규제해야 합니다. 매년 공기업의 부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임금과 복지혜택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가중될 뿐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을 규제하고 개혁을 진행함과 동시에 공기업들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도, 의료, 전기, 수도 등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기업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분야들은 조직의 규모를 줄이거나 통폐합, 민영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의 과정을 통해 얻은 이익과 재정의 확충으로 국민들 전체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즉, 공공부문에도 형평성이 아니라 기업에서 추구하는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 년 이후로 하락세이고 2025 년에 총인구가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제성장률 역시 아직까지는 3 퍼센트의 성장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2020 년 이후로는 본격적인 저성장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연금을 받을 사람들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대통령께서 대선후보시절 공약하신 증세 없는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형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업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공기관에게도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요즘, 곳곳에서 보수공사와 비슷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보도블럭을 뒤집거나 가로수를 뽑았다 심었다는 반복하는 행정낭비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의 도로에도 최근 들어 전신주 주위에 안전페스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뭔가 시끄럽고 공사를 하는 것 같지만 끝나고 보면 크게 개선된 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일이 십 년 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여주기 식 행정, 낭비만 반복하는 악한 관행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줄일 수 있는 곳에서는 줄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약하여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는 노력이 앞으로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공공분야에 있어서 기업에서 적용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S 기업 출신의 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곳곳에서 낭비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소 진통도 예상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희생과 피해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그리스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개혁으로 기업과 같은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

그리스는 유럽연합에 큰 골칫거리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국가재정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공무원에게 점심을 사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부는 무능하였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상태가 엉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율성을 바탕으로 복지를 위한 재정건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분야에 효율성을 적용하여 재정이 탄탄하고 합리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선진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⑨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현재 한국 경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점점 위축되고 있고 지금까지 한국을 지탱해오던 주요 기업들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11 월 월례토론회의 주제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복지"로 선택했습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두 분이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이사, 김원식 건국대 교수 등 두 분이 지정토론을 했습니다.

김종석 교수는 기업환경의 개선, 세금부담의 완화, 규제부담의 완화, 고용부담의 완화, 투자유인의 제공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하 교수는 고도성장을 전제로 하는 국가전략 자체를 재검토하고 저성장상태에서의 균형 구조에 대한 국민인식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이사는 기존 제도와 구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혁명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식 교수는 보편적 복지지출의 증가가 취약계층에게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가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토론에서 김원식 교수의 주장이 가장 공감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는 사치이며 비효율적이고 선별적 복지가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1998 년부터 2008 년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 년 기초노령연금을 시작으로 한 보편적 복지가 본격화된 이후부터 복지정책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1,2 분위의 이전소득 비율이 급감하고 3,4 분위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뭐가 옳은지 잘 보여준다.

복지정책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보편적 복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의 그래프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무상급식인데 무상급식을 옹호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과연 그들에게 이성이 존재하는지의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 등의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굶는 것처럼 말하는데 가난한 아이들은 이전부터 급식을 무상으로 먹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논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자신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공짜로 먹으면 아이가 자신의 가난을 인지하고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옷, 신발, 가방은 왜 지원 안하는지요?

옷, 신발, 가방 등 눈에 보이는 것들에 예민하지 아이들은 밥을 공짜로 먹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또 오히려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 이전과 달리 지원받는 예산으로 급식을 하게 되어서 급식의 질을 떨어뜨려 이전에는 맛있는 밥을 먹던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맛 없는 급식을 먹게 됐습니다.

급식이 맛이 없다고 돈이 있는 집 아이들은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시켜서 먹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예산은 낭비되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큰 차이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만 봐도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양질의 무상급식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2010 년 기준 상위 1% 법인이 법인세의 84.0%를 부담하고 상위 10%가 소득세의 68.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으나 경제학을 배우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로 인해 소득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하려고 한다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복지를 위해 자신의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거품을 물면서 부자라는 이유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혁명적 개조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살기 힘들어진 이유를 복지정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직된 노동시장, 불필요한 수많은 규제들,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부족한 이해, 정쟁만 벌이는 국회입니다.

정규직에 대한 너무나도 철저한 보호로 인해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은 하지 않고 비정규직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만을 욕할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정규직이 갖고 있는 혜택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에 너무나도 큰 부담인데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강제로 늘리게 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없애고 비정규직을 없앤다면 기업들은 채용을 늘릴 것입니다. 또 외국 기업들도 또한 진출하기를 꺼려하던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늘려 줄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차이가 사라지면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수많은 규제들이 사라진다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은 품고 있던 돈을 풀어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소득분배는 개선되며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언론들의 반기업, 반부자 선동에 쉽게 넘어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를 제대로 가르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를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경제세미나와 같은 강연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 국회에서 힘겨루기만 한다면 정말로 벼랑에서 떨어지고 우리 나라는 세계 변방 국가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정쟁의 주동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이라도 벌여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고 경직된 노동시장, 불필요한 수많은 규제들,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부족한 이해, 정쟁만 벌이는 국회 등의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우리는 벼랑 끝에서 벗어나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⑩ 이희진(선린대학교 간호학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년째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복지에 대한 욕구는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와 함께 모든 경제문제의 원인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에 있으며 내부적으로 무책임한 복지제도의 확대 도입과 재정적 한계로 인해 한국경제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 주최 제 90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문제를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현 정부에서 증세보다는 정부예산을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주장하였고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이사는 국회가 정치공학 구조에 따른 선택이 아닌 국익을 위한 선택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현재 정책방향으로는 바꾸기 힘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질과 양,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제도, 개방과 경쟁, 총 요소 생산성과 기술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기업환경의 개선, 세금부담의 완화, 규제부담의 완화, 고용부담의 완화, 투자유인의 제공 등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 기회를 찾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김종석 학장의 의견을 듣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복지와 고용에 힘을 써서 최대한의 인적자본을 최대효율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의 근로대우와 직업, 진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장애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텐데요. 이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률이 3퍼센트 미만인 데에 반해 미국의 전체 장애인 취업률은 25~30%로, 철저한 사회통합이란 큰 이념 아래 장애인들도 지원고용을 통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체에 고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밀러 전환센터에서는 4년에서 8년간 모든 학생들은 직업관련 수업에 참여하고, 직업기술을 배우지만 직업태도에 대한 교육과 독립생활기술도 가르칩니다.

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자동차외장관리, 직물 작업, 휠체어 수리, 제빵, 조경, 그래픽 아트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졸업 후 개인의 전문성을 살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며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직업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한 시간 교육받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개념의 복지가 필요합니다. 교육기관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하여 우선으로 장애인에게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포항의 커피전문점인 '카페 히즈빈즈'는 장애, 연령, 학벌, 성격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장애인들에게 사회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현재 포항시내에 7개점에서 35명의 장애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경제 불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빈곤과 차별의 이중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제공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시도와 인적자원 형성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 장애인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기술도 습득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발하기 위해서는 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근무환경이 보장되어 특정소수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만 확대하는 것이 아닌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과 인재를 발굴한다면 우리나라는 좀 더 선진국에 다가가지 않을까요?

⑪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선진화포럼의 11 월 월례토론회에서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우리의 경제적 상황을 논의하였는데요. 한국경제의 내부적 취약성 및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와 잠재적 돌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진단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는 20 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으로, 이제껏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전자, 자동자,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대외의존이 높은 대기업 위주의 주력 산업이 공통적으로 실적부진에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지적되는 바와 같이 그 배경에는 세계 경제 침체, 중국의 경쟁력 강화, 공급과잉 등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성장동력의 부재입니다. 내부적인 경쟁력과 역동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바야흐로 신 성장 동력에 눈을 돌릴 시점입니다.

주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불균형적 성장을 이끌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기업이 이끄는 경제성장률이 곧 청년실업문제와 고용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상권을 장악하는 현실에서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낙수효과는 이미 수십 년 전 사멸한 개념이지요.

한국은 말로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국민세금으로 4 대강에 자그마치 '수십 조'를 퍼부었지만 강바닥이 썩어가는가 하면, 야심차게 고집한 자원외교는 투자의 99% 원금을 날리고 폭삭 망하는 등 현실은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는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쓰여야 했던 소중한 자금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10 년도 넘은 과거를 언급하며 물타기하려는 꼼수도 여전합니다.

기존의 주력산업만을 의지하는 폐쇄적인 사고를 졸업하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고유한 내구력을 신장시키려면 새로운 산업, 즉 신 성장 동력을 집중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대외의존을 낮추고 내실을 다지려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시장 창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마치 음지에서 기생하듯 유착된 이익집단 및 관료조직의 조직적 저항입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막아 실업률과 가계부채를 누적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업문제가 최악의 사태로 치달으며 나라의 경제를 좀먹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포화상태인 대기업 및 공기업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구직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와 안정성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일자리가 다 찼는데 억지로 고용을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우수한 구직자들의 스펙과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 이미 만성적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의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편입되려는 경향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도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 즉 벤처정신과 중소기업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요즈마' 프로그램은 아이디어만으로 출발하는 벤처기업인들에게 자금조달을 해결해주는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털입니다. 우리와 공통적으로 징병제와 외부의 위협이 있는데도,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지원과 관심은 혁신과 창의성에 기초한 창업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힘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렵게 창조경제 성공사례로 선정이 되어도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토양에서 벤처기업이 이끄는 첨단산업이며 기업가 정신은 꽃필 수 없습니다. 젊은 엘리트의 해외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불균형 경제성장의 신화와 낙수효과의 허구에서 깨어나,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한국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처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⑫ 정복윤(고려대학교 정경학과)



벼랑 끝의 한국경제,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현재 한국 경제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일본의 기술 경쟁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같은 신세입니다. 지난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산업이 흔들리고 있고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 년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는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11 월 20 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복지편- 을

주제로 제 9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토대로 한국경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김종석 교수(홍익대 경영대학장)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분석하여 이를 위해 선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는 현재 저성장상태에서의 균형 구조에 대한 국민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영수(조선비즈 대표이사) 토론자는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음을 언급하며 국회가 국익을 위한 선택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원식(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정책에 대한 국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장잠재력, 인적자본 활용을 통해 달성하자!

필자는 이 네 분의 의견을 듣고 특히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김종석 교수의 의견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인 인적 자본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떠올렸는데요. 하르츠 개혁은 파트타임 일자리와 미니잡을 허용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달성하고자 했던 독일의 사례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은 실업자 수가 2001 년 308 만 명이었지만 2012 년에는 231 만 명으로 줄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도 하르츠 개혁과 같이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실업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의 양을 우선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필자는 실업자의 적극적인 취업을 위해 정부에서 크게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용돈벌이 20 대 학생이 아닌 3040 세대 구직자들을 위해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일을 통해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구직자의 심리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40 세대들은 구직자들은 일자리에서 점진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실업 후에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 배달 등의 분야같이 오랜 기간 종사에도 전문성을 인정받기 힘든 일자리만 존재한다면 그들은 취업하려는 의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임금이라도 이 과정을 통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구직자들의 취업의지는 향상될 것입니다.



전문성을 길러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저임금이라도 OK!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주어지면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취업하도록 정부의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복지체계로 도덕적 해이를 가지게 된 구직자들은 가끔씩 손익계산을 통해 일하지 않고 쉬면서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 번째 제시한 것과 같이 그들이 원하는 직종을 제시하는 점이 필요하며 이들이 그 직종을 거절했을 때 노년복지혜택 축소, 자녀복지혜택 축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실업자에 대한 복지재정절감과 동시에 취업률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들은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노동시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지만 보다 적극적인 취업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저임금이라도 한 분야에서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한국도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같이 잠재적 노동자들을 시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⑬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저성장, 저물가, 엔저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고있는 한국경제

현재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강자로 떠오른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재도약을 노리는 일본의 기술경쟁력 사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태로운 경제만큼 복지를 둘러싸고 두 가지 가치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김종석 홍익대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돌발사건으로 세계경제가 소용돌이 칠 때면 한국경제는 또 다른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20 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9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벼랑 끝 대한민국 경제,복지편'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선도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과 '야성적 본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되는 기업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3.5%의 저성장 속에서도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조선경제 i 대표는 경제, 복지 부문에서의 정치공학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역설했고,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대학재수, 취업재수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먼저 취업한 후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하 교수님의 '저성장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국가모형 구축'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성장에만 몰두한 우리나라가 숨고르기를 하며 대내외적으로 정비를 하고 다음 도약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 바로 현재라고 생각했는데요.



복지확대, 경제활성화는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증세가 바탕이 되야 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경제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로 최근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하고, 이웃나라 일본은 통화를 더 푼다고 하니,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떨여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전 세계가 어려운 지금, 성장도 중요하지만 저성장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즉, 양적성장만을 지속해오던 우리나라의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인 정부지출과 성장률이라는 수치에 매여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해야 할 때이지요.

현실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혁신이 없다면, 우리는 정부지출의 허리띠를 졸라 매서 내부적인 지출을 줄이고, 저성장 속에서도 정신적, 문화적 성장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지출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저성장시대 속 성장을 향해!

일단 정부지출은 줄이고, 복지확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8 조 5000 억 원 가량 구멍난 세수 실적은 올해도 예상치 대비 8 조~9 조 원 가량 부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결국 복지확대는 증세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수정이 이뤄져야 가능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력을 위해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겠지만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이나 낭비식의 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벤처를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 역시도 체계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연구비용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사업이나 벤처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규제철폐를 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저성장시대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의 균형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우리가 급속도로 발전해와 부족했던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저성장시대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하더라도 정신적인 풍요를 느끼게 한다면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도 완화될 겁니다.

성장에만 몰두해 잊었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 방안으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매주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아차산을 등산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공부, 아르바이트 하느라 잊고 지냈던 쉼을 바로 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산의 정기를 받아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활기찬 한 주를 시작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 속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높은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체제개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준비되기 전까지 한국경제는 양적성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부분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경직적인 우리나라에서 유연한 복지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보다 현재 우리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저성장 속의 숨고르기를 통해 선진화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제 4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서울대입구역 카페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을 내주어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점점 경기침체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외 상황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 중국의 추격, 일본의 반격은 한국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으며 이를 막아주던 방파제인 한국의 주요 5 대 산업 역시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저해시키는 고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규제입니다. 과거부터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뤄져 왔으나 그 과정에서 반발이 심했으며 개혁 없이도 현상유지가 가능했기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혁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제 개혁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일몰제, 규제총량제 등 선진국의 제도를 예전부터 모방했지만 그 실효성은 지금까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범정부차원의 규제관리기관의 도입을 그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규제의 증가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조선형 (서울대학교 재료공 3): 저는 규제관리기관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필요성 때문입니다. 역대정권의 규제 수를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의 초기 3 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에서 정권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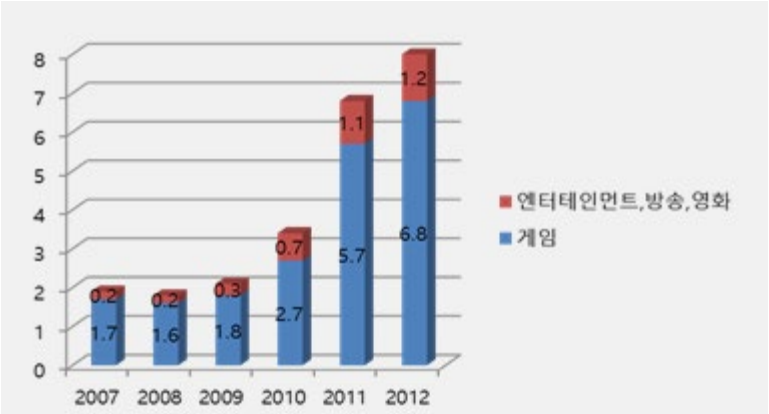
그나마 감소했다는 초기 참여정부 역시도 IMF 가 규제완화를 요구한 결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2008 년 5186 건에서 2012 년 1 만 3914 건으로 5 년 만에 26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규제완화를 외치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각 정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안을 확대, 도입하는 현 정부에서도 어려울 만큼 규제관리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규제관리기관의 도입에 찬성합니다.

오주현 (서울대 재료공 3): 저 역시도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 규제가 늘어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시장이 복잡해지고 각 산업별 특성차가 점차 심해지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 마치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도 워낙 다양하기에 같은 규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산업을 규제를 통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기구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박성찬 학우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형 학우의 생각과는 다소 다릅니다. 규제의 증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규제의 증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컨텐츠 사업에서의 수입은 대부분 게임이 차지하고 있다.

그 예로 게임 산업 분야의 여러 규제를 들고 싶습니다. 흔히들 컨텐츠하면 한류의 주역인 k-pop, 드라마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컨텐츠 산업에 대부분 수입은 게임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을 지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중국 등은 파격적인 대우로 게임 산업을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수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장 상황과 세계의 흐름을 외면한 채 사행성, 중독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게임산업의 규제 광풍으로 작년 게임산업 시장에는 찬바람만이 불었으며 결국은 다수의 전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극적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를 보아 잘못된 규제가 미래의 산업에 얼마나 큰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규제는 보호막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박재만 (서울대학교 재료공 3): 저는 박성찬 학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규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규제를 마치 억압하고 발목을 잡는 것처럼 예시를 들으셨는데 실제로 규제는 태양풍을 막아주는 오존층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어백처럼 사회적 완충 작용도 해주고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규제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히 개수를 문제를 드는 것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주현 학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상황이 복잡해짐에 따라 단순히 파이가 커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커지고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절대적인 개수가 증가한 것이지 이를 규제가 과해졌다고 단순히 치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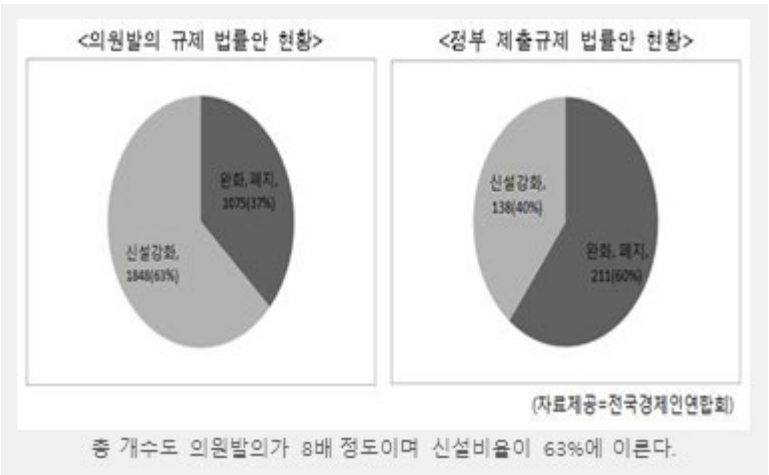
그리고 박성찬 학우의 의견처럼 규제관리기관을 만들면 오히려 각양각색의 시장상황을 파악하지 못할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지자체단위의 규제 개혁팀, 산업별 규제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 유연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희찬 (서울대학교 재료공 3): 저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기관을 범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만 학우의 말처럼 개별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 목적에 취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규제관리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 기관이 또한 정권의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정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 신뢰성을 검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힘을 실어준다는 생각도 듭니다.

산업의 진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규제를 하나의, 그것도 범정부의 기관이 갖게 된다면 그 위험성이 몹시도 걱정되는 바입니다. 만일 도입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관리기관의 도입이 아니라 몇 가지 제도의 도입으로 규제 과잉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2 년도 개원한 19 대 국회의원에 의한 규제입법 수는 2923 개로 정부가 발의한 349 개에 8 배에 달합니다. 또한 그 내용도 폐지, 완화보다는 신설, 강화의 비율이 높습니다.



총 개수도 의원발의가 8배 정도이며 신설비율이 63%에 이른다.

즉, 아무런 평가 방식이 없으므로 무분별한 입법발의가 행해지는 것이고 잘못된 규제가 생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평가제도를 실시한다면 지금과 같은 규제과잉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규제평가제도의 도입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경풍: 저는 관리기관 도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선 주희찬 학우가 말했던 규제평가제도도 결국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필요할텐데 그것이 규제관리기관과 성격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리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규제 개혁을 위해 국가가 실시했던 제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규제 개혁은 꽤 오래 전부터 대두돼왔고 이를 위한 여러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연도별 규제일몰제도 적용 현황]

	계	'03	'04	'05	'06	'07	'08
심사대상 규제수(건)	6,694	947	1,054	1,423	1,076	1,259	935
일몰제도 적용수(건)*	64	13	14	10	4	8	15
비율(%)	0.96	1.38	1.33	0.71	0.38	0.64	1.6

* '98~'02년 일몰제도 적용 건수는 37건

예를 들어서 급변하는 경제 성황에서 규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실효성을 잃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사라지는 규제 일몰제를 1998 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일몰제 도입 10 년간 적용된 규제는 단 101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을 보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관리하지 못하면 허울뿐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 실행된 개혁안들이 제대로 관리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규제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는 지경까지 오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을 관리하고 평가할 단일 기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성찬 학우가 제안하신 범정부차원의 규제관리기관의 도입을 찬성합니다.

박성찬 (서울대학교 재료공 3): 서울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우선 급증하는 규제와 다양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 규제관리기관의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단순히 규제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진 결과이지 규제 과잉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기관보다는 지자체, 산업별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더욱 유연하고 시장상황을 꿰뚫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범정부차원의 관리 위원회는 그 신뢰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도입할 시에는 적절한 대응책이 반드시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서울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결국은 적절한 규제를 통한 한국 경제의 성장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저희의 바람처럼 적절한 규제관리를 통해 다시금 기적을 이루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기업 시스템과 문화는 혁신이 필요하다.

임현수 (국문 4): 지금부터 제 4 차 서울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기업의 시스템과 문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저는 대외의존이 높은 대기업 위주의 기존 산업들이 점차 중국 등지의 기업에게 따라 잡히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안도현 (경제 4): 최근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과 함께 중국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던 중국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의 설 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석유화학, 두산, 이마트 등 한국기업의 점유율 및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인우 (지환 3): 중국에 나가면 돈 버는 기회가 열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 10 년 지나면 다 철수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조립&단순 가공 수출로는 한계가 뻔하지요. 원천기술이나 진입장벽이 높은 고도기술의 생산장비를 수출하는 형태가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서명범 (국문 3): 그리고 지금처럼 야근시키는 패러다임의 문화로는 조만간 한국 경제가 중국 등쌀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똑같이 쥐어짜보아야 중국은 아마 적어도 10 배는 더할 테니까요. 자본규모는 말할 것도 없이 상대가 안되고요.

그나마 지금 조금 더 선진화된 시스템 가지고 첨단기술 개발하고 창의성을 활용하는 식으로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10 년 지나면 우리나라 제조업 시장은 정말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주영 (성악 2): 이게 다 대기업들이 길게 보지도 못하고 공공이익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잘 나가는

중소기업 등골을 빼먹고 도태시키고 원가 절감만 부르짖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로 나오는 벤처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면 다 들어가서 잡아먹어버리니까요.

안도현 (경제 4): 우리나라 경제가 암울한 것이, 노동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쏟아 붓는 요소 투입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라,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되는 천연자원, 인적자원을 투입하며 정말 몇 년 안에 다 따라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효율이나 혁신보다는 내부 구성원들을 쥐어짜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로는 맨날 창조경제니 혁신이니 부르짖지만 기업문화나 업무방식이 80 년대 고도성장기의 관습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김주영 (성악 2): 장기 주식투자를 하려면 우리나라보다 중국기업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전망이 있어 보입니다.

박인우 (지환 3): 종업원 2 명에 대표 1 명인 국내 한 중소기업이 NASA 에 첨단 기술 수출한 예가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정말 이공계 발전이자 국격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뭄에 콩 나듯 이런 중소기업의 사례가 이어지려면 국가의 물심양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현수 (국문 4): 검색해 보니 연구개발에 7 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동안 연구비는 어떻게 조달을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서명범 (국문 3): 나사에 수출해서 다행이네요. 국내 대기업이었으면 그냥 베끼고 끝날 것 같은데.

박인우 (지환 3): 교수 한 명과 대학원생 몇 명으로 된 벤처회사들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좋겠지만, 무조건적인 반기업정서도 좋지 않습니다.

임현수 (국문 4): 특허가 워낙 무효율도 높고 조금만 바꾸면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 한 두 개를 들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긴다고 해도 손해배상이 미미합니다.

김주영 (성악 2): 애플 것을 그렇게 베낀 삼성이 얼마를 물어주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 수 있지요.

안도현 (경제 4): 어떤 대기업들은 사원들 모아놓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죽이고 기술 빼오는지 강연도 합니다. 여기서는 말 안하겠지만 유투브에 동영상도 있지요. 하도 이런 더럽고 치사한 일을 악독하게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벤처기업이 어려운 환경인지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네요.

서명범 (국문 4): 국내 대기업 신사업 부서에 있어본 선배들 말 들으면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임현수 (국문 4):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기업의 시스템과 문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하여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산업의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소위 굴지의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에 빠르게 따라 잡히고 있는 추세에서 여전히 혁신보다는 쳇바퀴 돌리듯 구성원들을 쥐어짜는 기업문화나 업무방식이 80 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NASA 에 첨단기술을 수출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많이 나오려면 허술한 특허보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관행 철폐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현 위치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4 차 서울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고려대학교에서 제 4차 선진화연구모임이 열렸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벼랑 끝에 놓인 것과 다름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 월 20 일에 한국선진화포럼에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경제·복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젊은층의 반기업정서를 어떻게 완화시킬 지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1) : 젊은 층들에게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리잡은 이유는 기업인들이 병역의 의무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삼성과 같은 재벌가의 자녀들은 병역 면제율이 일반인보다 높아 지속적으로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재벌가들은 높은 사회적 위상과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정적인 이미지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또한 대기업에 대한 반감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한국의 경제구조상 내수가 부족하고 무역 시장에 기대야 하는 만큼 대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해 피해망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국가를 경영해야하는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을 소위 '대기업 몰아주기식 정책'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나타납니다.

조선희(고려대 식자경 2) : 그렇습니다. 저도 김지용 학우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아버지가 대기업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개의 기업이 묶인 재벌그룹을 물려받는 재벌가의 자녀들이 젊은 층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박예슬(고려대 식자경 2) : 저는 특히 무능하더라도 상속받는 것이 젊은 층에게 반기업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 대한 착취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정관계가 모두 엮여있어 그들이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오너들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관대하게 처벌받습니다.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5 년이 총수 전용 형량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들에게 남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좀 더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 대기업 오너가의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부정부패 모니터링 시민단체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박예슬 학우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만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를 착취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기업들은 하청업체에 대한 착취가 현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이 끝난 후에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알아보시면 제 생각에 동의하게 되실겁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1) : 저는 또 다른 원인으로 언론이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면모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올바른 저널리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극성 위주의 기삿거리들만 취재하고 보도합니다.

'대기업의 장학제도 확대로 많은 재학생들 및 졸업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 라는 기사보다 '장학제도를 통해 재벌들이 자금세탁을 하는 의혹이 있어.' 라는 스캔들 기사를 언론과 대중들이 더 좋아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기업들의 긍정적인 면모 또한 적극적으로 보도해야만 기업 이미지 쇄신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통해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저는 반기업 정서의 원인으로 우리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을 들고 싶습니다.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하는 세력에 쉽게 선동되어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정부의 수출진흥책을 반대하고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교육 강화를 반기업정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능을 봤을 때 문과 약 40 만 명 중에서 3 만 명도 안 되는 인원만 경제에 응시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7 만 명은 경제에 대해 거의 무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처럼 경제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매달 1 번씩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특강을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적어도 거짓말에 속지는 않을 정도의 지식을 길러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희(고려대 식자경 2) : 전교조 또한 한 원인입니다. 이들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반감을 심어줍니다. 어렸을 때는 선생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이 때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교조에게 학창시절동안 세뇌당한 많은 젊은 층들이 반기업정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교조를 해산해서 학생들이 이들로 인해 반시장, 반기업투사로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박예슬(고려대 식자경 2) : 저는 대기업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반기업정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대기업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대기업들이 대학생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현대차그룹의 해피무브, 삼성그룹의 드림클래스, SK 그룹의 Sunny 등의 프로그램을 해보더니 그 기업의 팬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저의 경우는 대기업 관계자가 열은 강연에 간 적이 있는데 이 강연을 듣고 그 기업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관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기업들의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 후원 중 하나인 야구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1) : 기업들의 스포츠 후원 활성화도 좋은 해결책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모든 세대 중에서 스포츠에 가장 열광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을 기업들이 지원해준다면 젊은 세대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업들이 미워보일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이들의 호의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조선희(고려대 식자경 2) : 대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홍보를 위해 뽑는 서포터즈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서포터즈 활동들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틀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기업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를 보고 생각이 바뀔 사람은 없습니다. 고양시의 '고양이'처럼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다가가고 재미있게 홍보한다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언론이 대기업의 못한 점만이 아니라 잘한 점도 말하는 방안, 학창시절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는 방안, 전교조를 빨리 해산해서 이들이 더 이상 학생들을 세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기업들이 대학생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안, 기업들의 스포츠 후원을 활성화하는 방안, 기업들이 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서포터즈 운영 방식을 바꾸는 방안 등이 오늘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제시됐습니다.

이 의견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4차 선진화 연구모임이 진행되었다.

정복윤(고대정경 1) : 안녕하세요 여러분?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11 월 월례토론회 주제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복지 편-'입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 년째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와 복지부분의 해결점을 찾고자 많은 원로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잠재된 노동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재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정윤 학우부터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고대정경 1) : 저는 잠재노동이 주로 여성노동력에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육아 휴직을 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회사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실직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또한 육아비 역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라 보육시설에 맡기기보다 스스로 육아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잡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청년실업자 또는 노년실업자를 보육분야에 투입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실업자가 육아 휴직의 대체 인력이 된다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고급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고급 노동력이었지만 정년퇴직한 노년실업자를 투입시키면 될 것입니다.



일과 육아는 여성의 딜레마!

이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여성의 잠재노동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육아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본웅(고대정경 1) : 저는 잠재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균형한 노동수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산업 같은 분야는 매년 3 만 명의 노동공급의 잉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렇듯 과잉노동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정부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국제적 기업이 아닌 해외 중소기업을 학생이나 실직자들에게 연결해서 취직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급이 부족한 의료나 전자분야 등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전문성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50 대 실업자들도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재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0 세 시대에는 4050 세대들이 앞으로 지내야 할 시간은 많습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아니꼽게 바라보지 말고 20 대처럼 자연스럽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재취업 대상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노인실업자, 어떻게 고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강민서(고대정경 1) : 저는 잠재된 노동력을 일할 수 있는 노년실업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청년 실업자의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지만 노년실업자의 경우는 선택의 폭이 좁아져 아쉽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주도로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서 몇 퍼센트 이상을 노인을 고용해야 하는 등을 법률로 제정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예산으로 쓰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능하려면 직업교육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재인(고대정경 1) : 저는 한국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사람들이 임금과 처우가 좋은 대기업에 많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기업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연합을 맺어 기업을 신설하거나 제휴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통망과 자금력이 개선되어 안정감과 임금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척되지 않은 외국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MF 이전에는 소비가 많아 취업하기가 쉬웠지만 지금은 성장이 정체되어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활로를 찾아 수출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잠재노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복윤(고대정경 1) :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정윤 학우는 보육분야에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이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구본웅 학우는 불균형한 노동수급의 균형과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및 교육확대를 주장하셨습니다. 강민서 학우는 장년노동층의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제도도입을, 심재인 학우는 중소기업 연합과 외국으로의 활발한 진출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감사합니다. 다들 잠재된 노동력에 대해 '여성', '노년', '청년'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주었군요. 모든 학우의 부분이 다 일리가 있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한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에서 열린 제 4차 선진화 연구모임

김현성(이화 방송 4):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4 차 모임에서는 11 월 월례토론회 주제인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복지 편〉이었습니다.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간 이 시점에서 경제와 복지부분에서 우리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고착된 현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혁신으로 성장 동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슬(이화 방송 4): 말씀하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은 인적자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국전쟁으로 폐허된 전쟁터에서 다시 우뚝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적자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에서 핵심자원은 창조를 만드는 사람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결국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동력 '창조 클러스터'

함희수(이화 광홍 4): 깊이 동감합니다. 이슬 학우에 의견에 덧붙여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을 싱가포르를 본보기로 삼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싱가포르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자 창조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창조 클러스터의 개념은 '창조경제론'에 입각한 창조산업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즉 문화, 예술 분야와 함께 미디어 산업과 IT 분야, 디자인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죠.

싱가포르는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창조적인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싱가포르에 모이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혁신기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영토와 제한적인 자원을 두고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창조 클러스터의 핵심에서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비(이화 방송 3) : 네. 클러스터야 말로 첨단 기술 산업 육성과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클러스터를 통해 경제성장을 얻기 위해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의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우리의 내부 성장 요인만으로는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소현(이화 작곡 3): 저는 현재 중국이 한국경제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값싸게 많이 만들어 파는 전략으로 국제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높은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연구개발센터 유치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LG 디스플레이·SK 하이닉스·LG 화학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이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연구개발비를 역대 최대로 늘렸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연구개발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센터 유치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이슬(이화 방송 4):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연구개발에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R&D 국가'로 변신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1 조원의 설비투자를 하면 수백 명의 고용창출에 그치지만 같은 액수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수천 명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한국 기업도 살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함희수(이화 광홍 4): 맞습니다. 또한 R&D 센터를 육성하여 연구개발을 늘리게 되면 우선 우리나라 기업과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의 연결 관계가 더욱 견고해 질 수도 있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업들이 연구개발센터 육성 정책을 계속 해서 펼쳐 나간다면, 외국인 투자자 수를 점차 늘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즉,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방안으로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성(이화 방송 4):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간 이 시점에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 동력의 원천은 인적자원이라는 점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였으며 싱가포르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자 창조 클러스터를 진행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또한 클러스터의 투자 확대가 더욱 필요하며, 중국의 공세를 이겨내기 위한 연구개발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센터의 유치는 단순히 개발을 위한 공간을 건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중요한 요인인 FDI 의 증대, 더 나아가 창조 경제의 실현에 있어 발판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두 동의하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은 인적자원에 있다는 말을 저 역시 가슴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준 경제 성장 동력이 활성화 되어 한국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날을 희망하며 토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4 차 선진화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2일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제4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손민지(이화교육 3) :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선진화 연구모임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전달했다시피 지난 11 월 20 일에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그 중 경제와 복지에 대해 (재)한국선진화포럼 90 차 월례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1 위를 기록하고 있죠. 2018 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퇴직과 청년실업으로 근로시간은 단축되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복지를 수혜 받는 기간은 늘어나면서 복지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고령자를 근로자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고령인구를 근로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현아(이화교육 3) : 우선 고령인구를 근로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준비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을 살펴볼까요?

영국의 국제장수센터(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는 프루덴셜과 함께 유럽연합(EU) 지역에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유럽연합의 기관들 및 회원 국가들이 감수해야 할 역할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노인권익단체 에이지 영국(Age UK)이나 미국은퇴자협회(AAPP) 등 여러 단체들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더 늦지 않아야 합니다.



고령근로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정민지(이화교육 3) : 고령자를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 대한 차별을 막아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고용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고령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민들은 연령, 성별, 인종 등에 대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죠. 또한 '직업과 고용에서의 평등에 관한 2000 년 제 78 호 EC 지침'에 따라 고용과 교육, 채용에 있어서 개인의 여러 특성을 근거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인구의 근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연구에 의해 고령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법안에 관해서는 이현아 학우의 말씀처럼 그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홍보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윤아(이화교육 3) : 정민지 학우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고령인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게이츠도 59 세의 나이임에도 가장

혁신적인 분야에서 아직 활발히 일하고 있죠.

저는 고령자의 근로에 대한 우려가 바로 과거 여성에 대한 우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20 차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IAGG 2013)에서 미국 앙코르(Encore.org) 대표, 마크 프레드만은 지금 고령자들의 취업은 과거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할 때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엄청난 생산성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엔 여성이 일을 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못미더워했으니 말입니다.

이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고령자들이 과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만, 과거 여성에 대한 우려가 기우(杞憂)로 드러났듯 이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업무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연령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50 대 이상의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령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소리(이화교육 3) : 고령자들이 근로기간을 연장했을 시, 업무능력을 잃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트랜드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이때의 교육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리아의 경우 고령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강화시킨 우수사례로 손꼽힙니다. '기업의 사회적 혁신' 제도는 국가가 기업들에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요. 고령근로자에게 직업교육을 진행해 직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게 하고 더욱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기업 내 직업교육이 아니더라도 평생교육기관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노사발전재단과 고용노동부에서도 중장년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외국처럼 프로그램이나 홍보가 활성화되지 않아,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슬이(이화교육 3) : 고령자들은, 아니 청년들부터가 자신의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연령에는 자연연령, 건강연령, 정신연령, 영적연령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평균수명이 늘어나도 건강연령이 짧다면 근로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몸이 아프거나 약한 사람을 찾길 꺼리겠죠. 꼭 어떤 병에 걸려 근로를 못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몸이 아프면 일을 하는 시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어려워지고요.

우리들은 모두 늙습니다. 그렇지만 일해야 합니다. 다 늙어서, 퇴직 후에 다시 직장을 찾을 때 건강을 되찾으려 하면 늦습니다.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챙겨야 합니다. 아프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계속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늙어서도 건강하게 일하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한다.

손민지(이화교육 3) : 심도 깊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라 고령인구를 근로인구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고령인구를 근로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연구결과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고령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고령근로자의 업무 능력에 대한 우려를 타파하기 위해, 기업과 국가는 업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늙었을 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고령인구를 근로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토의해보았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열성적으로 토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④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11월 25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선진화연구모임

김초아(숭실대 행정 3) : 지금부터 숭실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경쟁력 약화, 세계경제 침체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있습니다. 게다가 고령화, 저출산의 빠른 증가 추세와 더불어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극심한 경제침체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할까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함께 불거지는 논쟁인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세금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세윤(숭실대 경제 3) : 저는 보편적 무상복지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보편적 무상복지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만 0~5 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무상보육', 65 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정도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제도들이 완벽히 시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공기업 부채, 공무원 연금 문제 등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상황에 무상복지를 무리하게 시행한다면, 예산 문제 등 현실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제도를 생각해봅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금융자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아닌, 고액의 금융자산가 등 잘 사는 집안 자녀들이 오히려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부터 개선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동등하게 복지를 해야 할까'의 논쟁이 아닙니다. 얼마 전 극심한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차등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희 (숭실대 일문 3) :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와 더불어, '복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 잘기 위한 것이므로 복지에 대한 지출 확대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 건정성을 잃으면서까지 '퍼주기'식 복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채 무조건으로 복지를 확충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기반마저도 같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벌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까지 했는데, 이는 곧 재원 조달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대안 모색 없이,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식으로 내세운 무상복지 프로그램의 극심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재정 부담 책임,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증폭

문수환(숭실대 경제 3) : 저도 선별적 복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처럼 세금을 많이 걷지도 않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무상 복지 프로그램을 점점 확대하게 된다면, 아마 머지 않은 미래에 국가 재정은 파탄나고 말 것입니다. 무리한 복지 확충으로 인해 경제가 무너진 그리스의 사례처럼 말입니다.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선별적 복지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계 효용을 따지면 똑같은 복지혜택을 주더라도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면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무상 급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부만 수혜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이는 곧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낙인 효과'이기 때문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급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입니다. 한정되고 빠듯한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다 보니 급식의 맛과 질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오히려 급식을 버리고 군것질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잔반 처리 비용의 증가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차라리 급식 이외에 수학여행이나 방과후 학습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문제에 있어선 그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합니다. 복지는 한 번 늘리게 되면 다시 줄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지요. 늘였던 혜택을 줄이게 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때문에 섣부른 무상복지의 시행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 차근차근 복지를 확대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월토(숭실대 경제 3) : 학우님들의 말씀처럼 복지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관건은 충분한 예산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정부 간의 갈등이 야기된 이유 또한 크게 보면 한정된 재원으로 갑자기 복지를 확대하려고 하니 일어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복지를 시행하기에 돈이 부족하다'라는 주장 보다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복지 예산을 확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가끔 논란이 되고 있는 호화 청사, 수요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 등으로 인해 낭비되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낭비되는 재원을 최소화 시켜 복지 예산을 확충한다면 지금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지자체에 무리한 복지예산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고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하고요.

김초아(숭실대 행정 3) :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데에 모두들 동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 복지 재원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제도 확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의 확대는 어렵다며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월토(숭실대 경제 3) : 성장을 책임졌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계속되는 한국의 저성장 추세로 보았을 때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연일 늘어나고 내수 경제도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당장 증세는 힘들지 않을까요? 따라서 증세는 불가피 하나,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윤(숭실대 경제 3) : 저도 증세에 대해 찬성하긴 하는데요, 문제는 국민들이 세금을 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만큼인지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세금의 환급성이 전제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증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의 비중을 더 늘려 소득에 따른 차등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인세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초아(숭실대 행정 3) :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법인세를 통해 당장의 세수 확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닐까요? 경제 성장의 핵심이자 기둥은 우리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각종 규제와 환율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영 상황에 법인세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기업 활동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까지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정작 피해를 보는 기업은 아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일 것입니다. 이는 곧 얼어붙은 한국경제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셈입니다.

이소희(숭실대 일문 3) : 저는 증세보다는 우선 포퓰리즘에 따른 무리한 복지 공약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고(Pay Go)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페이고 제도는 'Pay as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지출이 따르는 새로운 입법을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및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제대로만 정착된다면 포퓰리즘적인 무리한 정책이 줄어들어 복지재원에 관련한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높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포퓰리즘을 막지 못한다면 증세도 의미가 없습니다.



포퓰리즘으로 인한 복지재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페이고'정책

이종현(숭실대 경제 3) :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증세 관련 논의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관련한 국민의식이 뒷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무상 복지로 초등학생들에게 교과 준비물 등을 나라에서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이걸 공짜로 받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잃어버려도 잘 찾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비슷한 경우인데, 원래 아르헨티나는 예전에 경제 대국 중 하나로 부유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인해 무상 복지 정책이 늘어만 갔고, 이를 버티지 못한 국가재정은 파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은 복지를 더 늘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는 당연히 공짜다'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공짜기 때문에 주인의식 없이 낭비되는 자원도 많아질 것이며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초아(숭실대 행정 3) :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 복지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오늘의 연구모임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복지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인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에 논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모든 학우분들이 재정 건정성을 바탕으로 한 선별적 복지가 더 우선시되어야 하며 보편적 무상 복지는 시기상조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즉, 선별적 복지를 통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 예산 확충과 재정 건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요, 증세 자체는 불가피하나 당장의 증세는 아직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증세 방안에 있어서 간접세보다는 누진세를 늘리자는 의견, 법인세 증가 찬반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증세보다도 복지에 대한 전제조건이 더 중요하다며 포퓰리즘 정책을 방지하기 위한 페이고(Pay Go)제도의 도입,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복지정책'.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학우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⑤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지난 26일 한양대학교 제4차 연구모임이 진행되었다

김태준 :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국에서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양적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위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장만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복지에 신경을 써달라는 국민적인 열망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상복지나 보편복지, 선별복지와 같은 말을 언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와 관련되어서 많은 논의를 해볼 것입니다. 우선은

제가 앞서 나눠드린 프린트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복지재원 조달과 관련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영기 : 일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실현을 내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공약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약을 보면 이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날 복지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복지가 확대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지 않고 그러한 복지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우리세대에게 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태성 : 하지만 증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얻는 소득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소득이 소비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을 높이면 그 만큼 소비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현재 소비가 얼어붙었다, 내수시장이 침체되었다는 문제가 많은데 세금을 높이게 된다면 오히려 더욱 그러한 문제가 심화될 것입니다.

이경기 :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소비를 저해하는 요소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 제도의 경우, 정부에서 쿠폰 등을 나누어주면서 오히려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문화생활을 위한 여유가 없는데 정부에서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이를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라는 기능 외에 소비 진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복지제도 역시 이러한 특성을 지닌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증세를 통해 무조건 소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성우 : 바우처 제도가 나와서 말인데 과제 때문에 이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바우처 제도는 공공분야의 복지를 민간분야와 같이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필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영역에는 바우처 제도가 유의미할지 몰라도 그 외에 다른 분야까지는 포괄하지 못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이 부족한데 사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라리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김태준 : 너무 바우처 제도로만 의견이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나요? 정부 재정규모나 세금부담율과 같은 이야기도 충분히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기 : 2014 년 올해 정부 예산규모는 약 360 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복지, 보건, 고용 부분이 약 106 조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그 만큼 복지에 신경을 쓰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적자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정도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부채는 국내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뛰어난 편이고 증세 없이도 복지를 확대시킬 충분한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성 :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 부채만을 놓고 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기업의 부채, 지방정부의 부채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부채지표를 G1 이라고 보았을 때 공공기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지표를 G3 라고 합니다. 이때 G3 가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겠지만 결국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부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중앙정부 부채만 고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김영기 :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복지 부담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현재 그 부담률이 50%이상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고소득층에 대해 80%의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3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은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복지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데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복지의 확대로 인해서 생긴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됩니다.

사실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합니다. 1 차안전망 정도 수준의 복지는 굳이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충분히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만으로도 시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당면한 과제는 1 차 안전망 수준이 아니라 2 차 안전망 이상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세 없이 복지의 적극적인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할 것입니다.



2010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성남시는 2013년 말 채무를 청산했다

김성태 :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목표가 북유럽 국가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높은 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천연자원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의 비용을 최대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최소의 비용이라는 표현을 앞서 사용했는데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의미입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도 많지만 우리가 실제 피부로 체감하는 복지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문화사업이나 체험활동 역시 크게 보면 복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충당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수면 아래로 감춰진 폭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부채입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한 재정건전성의 판별에 G1, G2, G3 라는 지표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지방정부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특히 주 정부의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재정적자가 재정수입의 50%를 초과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시의 경우 자동차 산업의 몰락 여파로 파산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0 년 성남시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2014 년인 지금 성남시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충격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만 다른 지방정부 역시 채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리하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SOC 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김태준 : 지금까지 우리는 복지와 세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해 이를 충족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의 부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의견과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세 없이도 복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에는 오히려 증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소비심리가 더욱 얼어붙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증세가 필요하다고 한 의견에는 증세 없이 복지의 확대를 하는 경우 중앙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나아가 지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고 나아가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의 우려로 인해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무분별한 복지의 확대로 인해 포퓰리즘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우 치적사업을 위해 대규모 SOC 를 구축하는 모습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지와 세금은 반드시 서로를 생각해야 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역시 생각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위정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⑥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경희대 경영학과 학생들의 제4차 선진화 연구모임

류호영(경영 3): 안녕하세요.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경제의 고도성장과는 다르게 시민의식 수준은 아직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지난 11 월 20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복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모임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들의 대응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한국의 작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하여, 오히려 대외의존도, 아니 대외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대외활용도를 높인다면 세계를 휘잡고 세계 곳곳에 진출하고 세계로부터 자본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세계와 가까우면서도 곧 세계가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외국을 활용하는 주체로는 흔히 대기업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은 물론, 우리 대학생들도 외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수출대상을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고, 전 세계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 대학생들도 맘만 먹으면 쓰지 않는 중고물품을 외국 중고시장에 팔 수 있습니다. 경희대 경영대학에서 '국제경영' 강의를 가르치시는 김신 교수님께서는 "아마존을 많이 이용해보아라. 사소한 국제거래도 많이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 대외적 거래가 많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외활용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외국과의 거래에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가들과 기업들이 대외를 활용하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로 소주제를 잡았으니,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고지민(경영 1): 새로운 관점이네요. 저는 대외의존도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항상 이를 나쁘게만 생각해왔습니다. 역시 나라의 문을 닫고 우리 것만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듯 합니다. 류호영 학우 말씀처럼, 오히려 외국을 활용의 대상으로 보고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선 미래 사회의 주역 또는 기업가가 될 대학생들부터 해외에 대해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는 세계경제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 하네요. 상대방을 잘 알아야만 상대를 극복할 수 있고 다룰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기업들은 인재육성의 차원으로, 중국 칭다오와 같은 기업과 산업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해외현장으로 대학생들을 견학시키는 사회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상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 회사직원의 시장견학도 좋지요. 하지만 단순 해외여행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해외견학이 마치 제 2 의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말입니다.



1968년, 청와대에서 열린 수출진흥확대회의

정규식(경영 1): 맞습니다. 외국에 대한 개방적인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국에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개방적인 나라에 우리가 진입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대외활용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영자와 기업오너들의 강력한 해외진출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경영자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융권을 생각해봅시다. 모두가 금융권의 해외진출이 중요하단 걸 알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국가별로 금융관련 규제와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정부부처들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각국과 금융협력을 위한 협정을 맺는 등 금융외교 강화에 힘쓰고자 하는 의지를, 정부가 반드시 꼭 가져야만 합니다.

김양우(경영 1): 그 말씀을 하시니,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 년부터 15 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주재했다던 ‘수출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 보고회의’가 떠오릅니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과 정부가 매달 만나, 진취적 해외진출을 위해 고민하는 일종의 전략회의나 작전회의 같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신설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비슷한 바람직한 사례라 볼 수 있는 듯 합니다.



기업가 정신과 야성적 본능

박정훈(경영 1): 맞습니다. 김양우 학우의 말씀과 비슷하게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장은 ‘기업들이 다시 기업가 정신과 야성적 본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현재에

들어와서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국내에 아니라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를 향해 나아가는 터널을 정부가 뚫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업들이 터널을 통과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업가 정신으로 대표되는 '기업오너들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현 시점에서는 위험한 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전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사업·시장에 뛰어들거나, 기존 사업에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반영하는 의지와 실천! 리스크 테이킹을 할 줄 아는 기업가 정신이 더더욱 요구됩니다. 책《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로 유명한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정형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남들을 유독 의식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인 듯 합니다. 누구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야하고, 취업을 위해 토익·토플 공부와 대외활동을 하고, 별 다를 것 없는 자격증들을 따는 천편일률적인 삶의 과정을 당연시 여기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 마치 유별난 문제아가 되는 것처럼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바꾸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방송매체'가 가장 잘 이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송매체는 정형화된 삶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색다른 삶,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 새로운 일탈의 삶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그러한 삶도 성공할 수 있고, 돈이나 명예, 권력 등에 상관없이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남들과의 차별성이 오히려 성공의 열쇠가 되고, 자신을 빛내주는 개성이 될 것입니다.

류호영(경영 3):네, 이쯤에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요약해보자면, 고지민 학우는 상대를 잘 알아야 이길 수 있다며, 정부나 기업이 주최하는 정기적인 외국견학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또 정규식과 김양우 학우는 국가경영자의 해외진출 의지가 중요하다며, 해외진출확대회의와 같이 국가 최고권위자의 주재 하에 기업과 정부가 해외진출을 통한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박정훈 학우는 위험감수를 하지 않고 정형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방송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대외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대외활용을 하고자 하는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토론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선진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⑦ 동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동국대학교 진흥관에서 열린 4차 선진화 연구모임

송동근 (동국 호텔 1) :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동국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 차 모임에서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복지 편〉이였던 11 월 월례토론회 주제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 청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벼랑 끝에 놓인 현 대한민국이 기적과도 같았던 옛 한강의 기적처럼 다시 경제와 복지 등 모든 것들이 일으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복지 확대,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하며 정부지출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복지확대 부분은 더욱 신중히 결정하므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줄여나간다면 비약적으로 큰 상승 성장은 아니더라도 선진국의 세계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연현우 (동국 호텔 1) : 저는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복지제도의 개혁이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보여주기식 복지제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인데 이를 악이용하여 자신만의 권력 업적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결과물로 사용되는 복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비록 지나친 복지가 병이 되기도 하지만 현 우리나라의 복지는 이러한 복지의 개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실현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 보다 정말 실현 가능한 복지로 정책을 만들고 지금까지 있던 많은 복지들을 축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재 (동국 경영 1) : 저는 조금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보았는데요. 확실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가가 생각났습니다. 그 국가를 이루는 것은 우리들인 국민, 즉 인적자원인데요.

현 우리의 인적자원의 활용성은 정말 낮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인재는 많은데 사회에서 제대로 활약을 못하고 많은 이들이 취업난으로 날개를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눈이 높아서 취업난이 심할 수 도 있지만, 요즘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 더욱 취업난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해결방안으로 '박원순 - 1000 개의 직업'이라는 책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경제를 움직이던 시절 우리나라 학생들을 위해 만든 책인데요. 기업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직업과 창업이라는 것을 소개해준 대표 도서입니다.

이 책을 읽어본다면 자신들의 재능을 살려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일의 능률성도 높아져 한국 경제는 점점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서연정 (동국 고고미술 1) : 저 또한 권순재 학우의 말에 동의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너무 무분별하게 자신의 진로를 내세우지 않고 취업률만 걱정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이라는 시스템이 꿀처럼 달콤한 말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소수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결방안을 추가로 설명하자면 국가,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도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이라는 시스템을 더욱 홍보하고 발전시키면서 창업관련 정책과 제도를 방안&개혁한다면 대학생들의 심리적 압박감도 줄어들뿐더러 새로운 꿈으로 창업에 성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이 자주 하는 스펙 관련 사이트에 창업관련 공모전이나 글쓰기, UCC 등 더욱 많은 이벤트를 개최시키고 SNS 와 방송매체에서도 언급을 하면서 눈길을 이끄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미 (동국 교육 1) : 저는 현재 중국과 일본이 한국경제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한국경제는 일본의 기술 경쟁력과 중국의 가격 경쟁력 사이에서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제품을 값싸게 많이 만들어 파는 전략으로 국제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자동차, 철강과 같이 지난 30 여년간 우리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주요 산업의 기업들이 이 나라들로 인해 수출 애로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할 하나의 길의 확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높은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연구개발센터 유치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신양 (동국 행정경찰 1) : 저는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데 한 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에는 대표적으로 기업과 민간기업이 있겠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여 우리 국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장인데,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배려를 하며 준법정신을 가져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검증이, 국민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치고 서로의 이익에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모두가 동반성장하기 위해 뭉친다면 이러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을까요? 한번 모두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송동근 (동국 호텔 1) : 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한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며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 성장 동력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에 복지와 경제, 인적자원 등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모두 동의하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은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낸 경제 성장 동력이 활성화 되어 한국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날을 희망하며 토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⑧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제4차 서경대학교 선진화연구모임 개최.

우동식(서경대 경영 4): 지금부터 서경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경제 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공공분야도 효율성을 추구하자'라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월례토론회 자료들과 제가 작성한 칼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경제 분야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재차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지나치게 높은 임금과 판공비등의 세비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소선구제를 도입하고 각 선거들의 시기를 맞추어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규제와 개혁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민영화를 하고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학우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병훈(서경대 경영 4): 사회자분께서 보내주신 칼럼과 자료들 잘 봤습니다. 먼저 사회자분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활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혜택들은 너무 과도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를 위한 업무 외에 다른 부분에 해당하는 혜택들에 대해서는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원(서경대 경영 3): 저는 여의도연구소라는 곳에서 대학생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활동을 하며 국회의원분들 몇 분을 만나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세금 과도하게 사용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니 제가 좀 경솔한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나 뵈었던 국회의원 분들을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보셔야 할 곳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느꼈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단순한 직업이라는 자리로 인식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유경(서경대 경영 3):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조직을 한 개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도 그런 것 아닐까요? 단순하게 개개인만을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김명진(서경대 경영 4): 앞선 학우들 의견에 심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개개인과 단체의 좋고 나쁨의 문제를 떠나서 판공비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도서관을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 매번 국회주차장에는 고급 자동차들이 즐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국민의 대표는 고급자동차를 타야만 하는 것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굳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식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부족해서는 안되겠지만 확실한 것은 현행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황예린(서경대 경영 3): 저도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판공비의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 국회의원들은 철도, 항공 등등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선구제의 도입도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구간의 인구격차가 심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1 만 명인 선거구의 대표와 15 만 명인 선거구의 대표가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대비 적절한 국회의원 수를 조사하여 국회의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합니다.

서인혜(서경대 경영 3): 아울러 매년 선거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정부에서 한 번 진행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투표로 선출하는 공직자들의 경우 임기를 맞추고 일정을 조절해서 일 년 내에 선출하는 것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우중(서경대 경영 4):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새로 선출된 사람들이 자리에 앉게 되면 업무 파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해'를 정해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되 한꺼번에 모든 공직자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정도에 나누어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동식(서경대 경영 4): 플랜 A 와 플랜 B 의 방식이네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정성진(서경대 행정 3): 공기업의 방만경영 역시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소위 청년들 사이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차고 넘치는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반 시민들의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녀들의 학비지원과 각종혜택들은 수준과 종류, 가짓수만 보더라도 입이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쌓인 부채는 공적자금 즉, 국민들의 혈세로 보전되는 것인데 옳지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에 적극 찬성합니다.

박지은(서경대 경영 3):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를 비롯하여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잘 지켜지는 곳 중 한 곳이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필요하고 원할 때 휴가도 사용하고 사원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세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 공기업입니다. 일반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대기업도 내부적으로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공기업과 공공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무조건적인 통폐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부문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이 방만적으로 경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회자분이 제시하신 것처럼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기업끼리도 경쟁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민영화를 통해 해당 분야를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가격인하와 효율성을 올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초로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 공기업을 늘리고 경쟁을 통해 공기업들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청년취업도 해결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들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의 큰 복지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은지(서경대 경영 3):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 것이 공기업에 입사하는 선배들이나 주변사람들을 보면 다들 스펙이 좋고 스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을 제대로 감시하고 잘 운영만 한다면 분명히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예린(서경대 경영 4): 사실 지금의 공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부채만큼만 국가가 재정이 확충된다면 공기업을 추가적으로 설립해서 양질의 일자리들을 다수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기업들의 운영을 좀 더 현실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찬성입니다. 아울러 박지은 학우의 역발상에 정말 대단함을 느낍니다.

우동식(서경대 경영 4): 오늘의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마지막이라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혼신을 다해 열띤 토론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국회의원들의 판공비와 관련하여 현재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데 다수가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선구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선거비용을 절약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관련하여 부채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데 다수가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기업이 양질의 일자리이므로 감시와 개혁을 통해 현실화할 필요는 있지만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고 복지혜택의 규모를 줄인다면 국민들에게도 유익하고 국가재정에도 이로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쪼록 마지막 토론까지 성실하게 참여해주신 분들을 포함하여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⑨ 포항지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제 4차 연구모임

현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복지에 대한 욕구는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4차 연구모임에서는 제89차 월례토론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따른 복지정책의 개선방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20대인 우리는 경제침체라 하면 취업난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데요, 청년들이 제안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김도진(한동대 글로벌리더십) : 우리나라엔 70% 이상의 대학 졸업자들이 있지만 인적자원이 일자리부족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재능과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이 일반 기업에서 오랜 기간 말단으로 일을 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우선 청년들이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큰 이유는 높은 연봉과 사회적 지위와 인정 그리고 기업 내 복지입니다. 당연한 현상 가운데, 국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기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상향평준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육성에 투자적 복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텐데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이 창업 자금이 없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일본 등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한 것은 41건에 이르렀고 무려 2조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국내시장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벤처사업을 지원하고 일정 성과를 이루었을 때 세금을 걷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지(한동대 글로벌리더십) : 저는 주요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OCED국가 평균 고용보고 지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은 정규직과 임시직의 비율이 거의 같은 같은 데에 비해 한국은 정규직 2.4, 임시직 1.4이고, OECD국가 평균은 정규직 2.11, 임시직 1.76으로 우리나라가 OECD평균에 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지수는 높은 편이나 비정규직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는 약한 데에 반해 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지나치자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 노동의 활용을 확대하게 한 유인동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직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고,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은 임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주 측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급여와 고용기간이 일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최근 영화 '카트'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제도로 비정규직의 근로가 보장되어야 하며 용역업체를 통해서가 아닌 기업과 개인이 거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많은 공공서비스부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보장받고 기업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진(선린대 간호학)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제도에도 개혁과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최근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복지정책이 일종의 표심 공략 수단이 돼버려 경제침체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현재 경제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복지정책 및 방향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신의(한동대 글로벌리더십) :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도는 좋으나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복지정책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실행 가능한 복지로 정책을 축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는 보편복지가 복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복지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별과정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소득수준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불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복지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는 선별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지역과 연계하거나 학교 동아리 혹은 산학협력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전공학생들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선별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는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승윤(한동대 글로벌리더십) :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 것이 우선, 지역과 연계해서 공무를 분담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생 혹은 동아리 단체의 학생이나 인턴이 일을 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에게는 이 일이 업무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여 오류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을 고용할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 분담이 어렵습니다. 저는 선별복지를 하되 그 감사가 철저해야 하고 소득수준을 제대로 집계하는 시스템과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복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복지혜택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카드를 사용하거나 앞선 의견과 같이 학생 인턴을 고용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복지 혜택은 장기계획을 세워 학업과 경제활동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추가혜택을 제공하거나 방문교육을 기회를 제공해 직접적인 혜택과 성과가 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진(선린대 간호학) :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경제가 활발해지는 방안과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자체를 통한 벤처기업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 격차를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가 더욱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선별복지를 할 때 선별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비롯한 대학생 인턴을 고용해 좀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감에 더욱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연구모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4차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⑩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명지대 학생들이 바라본 저성장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조아라(명지디미 3) :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명지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강자로 떠오른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재도약을 노리는 일본의 기술경쟁력 사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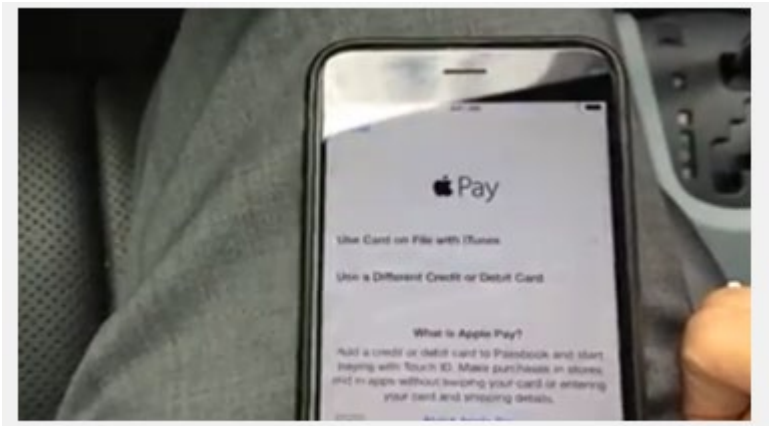
또한 위태로운 경제만큼 복지를 둘러싸고 두 가지 가치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20 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9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이날 발제자인 김용하 교수님의 '저성장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국가모형 구축'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성장에만 몰두한 우리나라가 숨고르기를 하며 대내외적으로 정비를 하고 다음 도약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 바로 현재라고 생각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 속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높은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한국경제,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나요?

이유진(명지디미 3) : 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경제는 어느 때나 항상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한강의 기적'과는 또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과도한 성장은 어렵죠. 그래서 저성장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성장만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요 없는 규제 철폐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없었다면 충분히 우리도 해냈을 '애플페이'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애플페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 애플페이가 모바일 결제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존의 업계에서 하지 못한 기술적 혁신이 아닙니다. 현재 결제기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소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혁신적인 모바일 결제방식이 나오더라도 업계 금융사와 법적 규제에 막혀 시행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용카드를 대체할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산업에 진입장벽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불필요한 국가가 아닐까요?

이종윤(명지디미 3) : 네,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는 그보다 더욱 기초적 문제에도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는 과도하게 불어난 정부지출을 줄이고 한번 시행하겠다고 나서면 되돌리기 어려운 복지문제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상당히 안좋아지고 있는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리고 있지요.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를 명목삼아 각종 재정지출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적자편향은 강력히 제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다른 국가보다 그 높아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내년 재정도 늘어난다고 하니,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라도 생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역할에 더해 국가가 재정준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는 임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의 의회예산처, 스웨덴의 재정정책위원회, 영국의 예산책임처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들은 재정건정성과 적자중립성 등 정부지출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곳인데요. 우리도 이들과 같은 독립기구를 도입한다면 방만한 국가지출과 경영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인들 역시 저성장 시대에 좀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세금삭감 등의 정책으로 한 표를 얻을 순 있겠지만 이로서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후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애초에 국회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하고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인해야 해요.

단통법과 같은 법처럼 어느 한 주체를 겨냥한 벌주기 식의 정책도 표면적으로 확인 가능한 팩트와 동시에 그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시스템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짚은 후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국민들이 겪는 혼란을 생각해서라도 신중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조아라(명지디미 3) : 네,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체제개편이라고 해서 너무 거시적인 문제만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실질적인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성장시대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의 균형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우리가 급속도로 발전해와 부족했던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성장시대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하더라도 정신적인 풍요를 느끼게 한다면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도 완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준식(명지전자공 4) : 나눠준 자료를 읽어보면서 전에 했던 '시민의식'에 대한 연구모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네요. 앞선 시스템적인 문제도 물론 해결돼야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느라 그 동안 놓치고 있었던 의식과 삶의 질 문제도 분명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조아라 학우는 글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주장했는데, 저는 이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했습니다.

저비용으로 잃어버린 삶의 질을 되찾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연구모임 시작 전에 여러분과 사담을 나누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가가 발달하고 이에 따라 여가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점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이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자연을 통해 얻는 심의 질 향상은 저성장 속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을 활용한 여가활동은 적은 것 같습니다. 조아라 학우가 가끔씩 아차산을 오른다고 했는데, 저는 올해 산을 가본적이 없습니다. 뉴스영상이나 친구들이 보내주는 사진으로 낙엽감상을 할 뿐이지 지나간 가을을 만끽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대신에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스포츠도 저비용으로 건강과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고효율을 내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피곤하다고 집에만 있지 않고 몸을 개운히 하는 스포츠와 운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물론 이를 위해선 강도 높은 업무부담이 줄어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2 위로 연간 2163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치인 1770 시간보다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더 문제는 노동시간 대비 생산성은 58.7%로 평균대비 80%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현실화시키려면 시간만 채우면 끝나는 업무로 업무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일찍 업무를 마치면 일찍 퇴근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삶을 좀 더 활기차게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하고, 주말에는 몸을 움직여 산을 오른다던가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를 위해 소비하는 건 여가산업을 발달시키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아라(명지디미 3) : 잠깐 이야기 하자면, 매주 오르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가는 아차산 등산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는 활동하고 있는 포럼의 교수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는데요. 교수님이 들려주는 건강지식 외에도 자연을 몰입해서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그 다음주를 아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여러분께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박유진(명지디미 3) : 저는 사회적 분위기가 약간 유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 에서 워킹맘들의 고충을 듣는 토크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워킹맘들은 법적으로 출산휴가가 주어지지만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팀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주거나 혹은 내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진 않을까, 혹은 남자와 비교하는 상사를 우려해 워킹맘의 경력단절이 가장 컸습니다.

사회적인 복지기구와 복지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우리사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복지정책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단은 복지정책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최근 독감예방 주사를 집 앞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되셔서 접종을 하셨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층 등과 바쁜 직장인들이 제대로 복지를 챙기려면 이러한 홍보가 중요합니다.

이어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는 국가로부터 줄곧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복지정책을 제대로 이용하자는 취지입니다. '마음의 소리'라는 편지는 군의 내무반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고발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워킹맘의 고충이나 회사 내에서 '상사가 퇴근한 후에 퇴근'하는 우리 기업문화에 적용하면, '마음의 소리' 편지로 평소 하지 못했던 기업 내 불만이나 칭찬을 서로가 터놓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면전에 쓴소리 못하는 우리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방법이 좀 더 유연한 사회 조성에 작지만 물꼬를 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아라(명지디미 3) : 네, 소중한 의견개진 감사드립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연구모임에서는 저성장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거시적인 시점에서 불필요한 규제철폐가 현재 저성장시대에서 새로운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만한 국가지출을 줄이고 재정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지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회와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대신에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법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보다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자연과 스포츠를 활용한 여가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있던 복지정책을 제대로 활용하는 취지로서 유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서로 복지와 관련된 불만과 문제점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편지'의 개념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오늘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저성장 한국의 앞날'이라는 주제로 명지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소박하지만 참신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른데요. 여러분처럼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이상으로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진화 과제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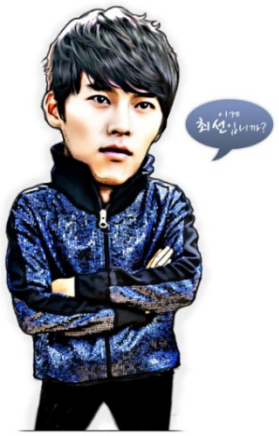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학생과의 대화

(제 70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강소라(서울여자대학교 콘텐츠디자인학과)

지난 2011 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시크릿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이 드라마는 특히 여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이유는 여성들의 로망을 실현시켰기 때문이다. 가난한 여자와 부잣집 남자가 만나 사랑을 이뤄가는, 조금 환상적인 내용이 가미되었지만 여심을 울리기에는 충분했다.



역시 국민드라마답게 여러 히트장면과 유행어를 낳았는데, 이 중 단연 돋보였던 대사는 '이게 최선입니까?'라는 대사다. 이것은 극중 부잣집 아들이고 잘 나가는 백화점 사장인 남자주인공이 주로 서류를 제출하러 온 회사직원에게 하던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직원은 최선을 다했냐는 말에 당당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다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장면이 많았다.

나는 오늘 이 말을 차기 대통령후보들에게 하고 싶다. 이들의 공약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한 칼럼을 많이 읽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평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가장 공감이 많이 될 교육에 관한 공약만 봐도 그렇다.

박근혜	내용	문재인
0~5세 무상보육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	무상보육	0~5세 무상보육 12세미만 아동에 월 10만원 수당
점진적으로 확대	필수예방접종	점진적으로 확대
매년 50개씩 확대, 기존 어린이집 100개씩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2017년까지 아동 40% 국공립 이용하도록 확대
고등학교 의무교육	의무교육	유치원 의무교육
계층별 차등지원 통해 명균 반값등록금 실현, 셋째아이 등록금 면제	반값등록금	2013년부터 국공립대부터실시, 2014년부터 사립대로 확대
5년간 44조원	필요재원	5년간 41조 5000억원

▲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무상보육정책 비교

보다시피 가장 박빙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한두 푼이 아니다. 이들의 이런 막대한 재원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방안 없이 표심을 얻기 위해 양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출구조 효율성 증대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증세 방안에 대해선 양측 다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대해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은 이들이 말하는 재원확충 방안은 평상시에도 정부나 국회가 계속 주장해온 것으로서 추가적 신규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반값등록금도 이렇다. 이들의 공약은 보기 좋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확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시점에서 아까 했던 드라마얘기에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을 다시 짚어보자.

내가 말하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늘 직원에게 '이게 최선입니까'라고 물어봤던 남자주인공은 직원이 가져온 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 일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조사의 내용은 '차기 대통령이 공약을 어느 정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이 이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9%가 '공약의 절반도 실천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에게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몇 개쯤 아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1.2%가 '1~3 개 정도 안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4~6'개(25.6%), 7~9 개(3.8%), 10 개 이상(2.5%) 순이었다. '거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12.6%였다.

최선을 다했냐고 묻는 이와 최선을 다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둘 다 준비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민을 향해 '저는 준비된 대통령입니다.'라고 최선을 다해 외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대통령에게는 '최선을 다해 당신의 공약을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과 국민이 필요한 것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1~2 개 정도밖에 모르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제대로 생각도 안 해보고 무작정 표를 얻을 수 있는 공약만 내뱉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국가야 말로 최악일 것이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도 최선을 다했는지.

② 김재원(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지난 11 월 26 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주최했다. 동일한 주제로 12 월 3 일, 숭실대학교에서는 선진화 연구모임이 진행되었다.

경제민주화 = 더불어 잘 사는 사회 ! & ?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평등의 개념이 경제에 부합되는 것이 혹자에겐 석연찮은 구석이 가득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 논리를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용어 자체가 '신조어'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 역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강력하게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재벌 독식의 구조에 정부가 손을 대서 상생의 길로 가보자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고, 대외적인 경제지표를 봐도 역시 두드러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나라 같겠지만, 실제로는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즉 양적인 성장의 한계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국가의 이미지는 좋을지 몰라도 속사정은 영 엉망이라는 것이다.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개선시키자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한 학생들 의견을 들어봤다. 찬반의 토론이 나오기보다는 모두가 강력하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어느 정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선호하는지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를 찬성하는 학생은 없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옹호하는 학생도 없었다. 민주당이 스스로 진보라 하며 복지부문에 큰 목소리를 내는데, 현실적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 안철수!

자연스럽게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 연구모임 멤버들은 기득권, 구 정치, 부패, 불신, 실망 등 기존 정치권에 대해 여러모로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다며 안 전 후보를 지지했었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 경험의 부재가 그의 발목을 잡는다는 뉴스를 적잖게 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모임 멤버들은 부패하고 낡은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느니 차라리 신선한 인물의 새로운 도전정신과 진정성을 갖는 것이 훨씬 국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더불어, 안 후보의 사퇴로 소중한 한 표를 어디에 행사해야 할지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진짜 소통을 하는 대통령

SNS 가 확산되면서 이른바 소통의 시대라 불리는 요즘이다. 확실히 사회적 소통에 있어서 많은 부분 새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치계, 정치계 가릴 것 없이 국민들과 소통해보고자 SNS 에 집중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SNS 가 확산되고, 정치계에서 이를 활용한다고 해서 국민과 정부의 소통이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 눈으로는 보고 있을지 몰라도 귀를 막고 있는 실정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것에 높은 평가를 주지도 않을 것이다. 정말로 소통(Communication)이 되는 정부를 원할 것이다. 일례로,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획기적일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대통령과 국민 한 개인이 원활한 소통이 된다고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드러나 있는 것만큼이나 실효적인 모습을 국민은 원할 것이다. 겉과 속이 합치되어 국민에게 진솔하게 접근할 때에 비로소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바를 정 다스릴 치

정치를 한자로 풀어 보면 아주 단순함을 알 수 있다. 아마 정치인 대부분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마냥 어렵기만 하므로 이해만 해야 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대선 후보들은 감성적인

전략을 통해서 국민에게 접근한다. 이런 점을 마냥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고 본다. 그게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그간 속아왔다.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속아왔다.



리더의 자리는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만 무엇이든 기본에 충실하고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 늘 노력하면 좋은 결과에 가까이 갈 수 있듯,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지금의 후보들 역시 정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마음을 갖고 국민을 향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본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이번 대선 후에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그간 실망을 안겨줬던 모습이 아닌 정말 새(new) 대통령이 나오길 희망한다. 비단 나만의 희망이겠는가.

③ 김정원(경북대학교 경영학부)

대통령 임기 말 매 5 년마다 연례 행사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비리로 인한 대통령 친·인척들의 검찰 출두가 그것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역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계속되는 그야말로 이제는 '전통'이 되어갈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 아래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도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역대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살펴보면 우선 대표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제 전기환씨와 전경환씨의 비리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전기환씨는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전경환씨는 새마을운동본부 회장을 맡아 70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법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촌처남 박철언씨가 슬롯머신 업자로부터 6 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비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대통령 관련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아들 김현철씨의 30 억 원 수수혐의와 사촌처남 손성훈씨의 1 억 9 천만 원 횡령 혐의로 인해 대통령 친·인척비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일·홍업·홍걸씨의 각종 게이트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의 30 억 원 수수 혐의, 마지막으로 이명박 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까지 지난 1980 년부터 현재까지 결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이 정에 너그러워서 차마 쓴 소리를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계속되는 대통령 관련 비리들로 인하여 그 동안 정치권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선과정에서 각 후보자들 중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를 약속하지 않은 후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후보들이 내놓은 비리 방지 관련 공약 중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로부터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제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기구의 마련 등과 같은 제도가 아닌, 애초 비리로 인한 혜택보다 더 독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해결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비들이 꽃을 보면 달려드는 법.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친·인척인 그들에게 뻗치는 유혹의 손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청와대의 내부감시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하고 친·인척들 스스로의 다짐도 대통령이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정권 말마다 대통령 친·인척들이 줄줄이 감옥을 가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됩니다. 지난 날보다 헤쳐나가야 할 미래가 더 많은 우리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완벽하게 비리 관련 없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④ 김화랑(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법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법 조항이 존재하기에, 혹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필자는 나의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본다. 여기서는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역사를 거슬러, 1945년 8월 한민족은 35년간에 걸친 민족적 시련을 극복하고 광복을 맞았다. 그러나 민족의 광복은 그대로 독립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국토분단의 비극과 민족분열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가져왔다. 역경 속에서 1948년 8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출범시켰으며,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새 국가로의 발전을 다짐하였다. 1950년 6·25전쟁의 민족적 비극을 맞았으나 자유당의 제1공화국, 민주당의 제2공화국, 공화당의 제3공화국, 유신후의 제4공화국, 10·26 후의 제5공화국·제6공화국을 거쳐 제2공화국 2기 문민정부가 수립되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산업체제의 수립이 추구되면서 사회적으로 복지사회를 지향하며, 대중문화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이 같은 민족적 과제 속에서 문민정부는 세계 속의 한국, 한국의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간단히 말하여 '국민의 지배'라는 의미이다. 민주주의는 귀족제, 군주제, 독재체제에 대응되는 단어로서, 만인이 평등하며 인간은 존엄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길게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을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는 민주주의가 꽃 피었는가?' 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기호1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 물론 그가 행했던 친일행위, 공산행위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과오라고 평가해야 옳다. 이 글에서는 그의 독재체제 하 산업화 역사를 다루고자 한다. 어떤 이들은 박정희가 국가 경제를 성장시킨 주역으로 산업화를 일구어냈다고 칭송하며, 또 어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한

매우 잘못된 독재자라고 규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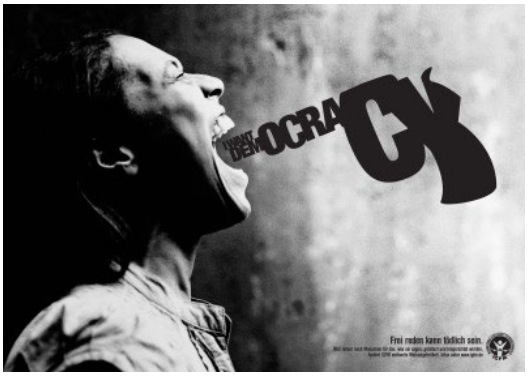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광복 후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를 이뤄냈고, 현재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역사에서 민주화 역사로 가기까지의 그 사이 기간은 공백으로 존재했던 시간이 아니라, 싸우고 부딪히는 등의 복잡하게 얽힌 여러 과정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왕정시대, 일제강점기, 6·25 전쟁 후에 바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바로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민주의식이 사람들한테 생기면서 과반 이상이 민주주의를 원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민주화 시대를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광복 직후, 소수 정치인 집단이 민주주의를 하자고 헌법 개헌한 것은 민주주의지지자들의 독재이다. 정말 민주주의로 하고자 했다면 그 또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결정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민주의식은 배우지도 겪어보지도 못한 왕정과 일제강점을 겪은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머리로만 아는 지식인 및 정치인들만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즉,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인권이나 주권은 있을 수도 없고 민주의식도 생겨날 수가 없다. 진실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이 직접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쟁취하였을 때에서야 정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빈국의 민주의식을 배우지 못한 국민이 민주화 운동을 일으킬 정도의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바로 국민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어 살만해졌을 때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산업화 과정이고, 이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전대통령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식인들은 산업화를 일구어낸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매도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다음은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앨빈 토플러(제3의 물결저자)'의 방한 시기에 중앙일보에서 그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민주주의 확산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발상은 사기(fraud)예요. 민주주의의 개념을 너무 순화했어요. 선거를 치렀다고 다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의 단계와 연관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데, 1차(농업 경제) 물결의 전통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어려워요. 적어도 2차(산업화 경제)와 3차(지식기반 경제) 물결이 민주화의 조건입니다. 상대국의 문화·경제환경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플러그 꽂듯 집어넣는 것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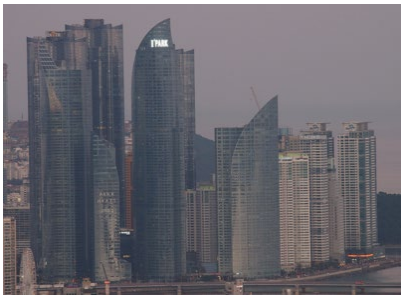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산업화 과정 후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산업화와 민주화 동시에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3요소인 의식주가 갖추어진 삶, 즉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삶에 도달하지 못하였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법만 만들고 바꿔서 선진국인 나라를 찾을 수나 있을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모두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었다. 산업화 시대의 정권과 민주의식이 생긴 사람들 간의 마찰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역사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원하여 이 땅에 꽃피웠다. 그러나 그에 앞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산업화를 받아들였다. 그렇기에 산업화를 지시한 박정희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독재자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국가 경제를 엄청난 속도로 성장 및 발전시키고, 산업국가로 일구어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옳을 것이다. 대통령 시기의 그를 비판하고 그의 과오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바라지 않은 독재를 행했다는 점, 권력을 계속 붙잡기 위해 유신 헌법을 만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점, 자신의 체제를 돈독하게끔 하기 위해 무차별하게 국민을 고문하고 죽인 점, 민주화 인사를 납치·고문하고 지역주의를 형성한 점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의 6요소를 그의 집권시기에는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를 비판하여야 할 것이다.

진실된 민주주의란, 민주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덕분에 이 땅에 살고 있다.

⑤ 민숙희(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영문학부)




화려한 고층빌딩에 사는 노인과 쪽방에 사는 노인. 하지만 고층빌딩의 노인은 기초노령연금혜택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 높인 노인은 기초노령연금혜택에서 제외되었다? 믿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주위에 이런 케이스가 상당수인 것 알고 계시나요?

복지 사각지대. 사각지대란 군사용어로 무기가 닿지 않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뜻합니다. 즉, 복지 사각지대란 기초 생활 수급자로 인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신 반면, 그 조건에 안타깝게 빗겨나가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 자격에서 제외된 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 세 이상의 노인이 가구주인 노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 년 이 노인가구의 비율이 17.4%이었는데요. 2030 년에는 약 32%로 증가할 거라고 해요. 노인단독가구 즉, 독거노인도 총 가구 중 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도 2030 년에는 총 가구 중 약 12%를 차지할 만큼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 추이]

(단위 : 가구, %)

	총 가구	노인 가구	(구성비)	독거노인가구	(구성비)
2000	14,507,010	1,733,525	11.9	543,522	3.7
2010	17,152,277	2,982,240	17.4	1,021,008	6.0
2020	19,011,815	4,231,578	22.3	1,512,082	8.0
2030	19,871,144	6,410,665	32.3	2,338,354	11.8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7

편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과거에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며 서로 돕고 살펴주던 시대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개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삶을 추구하는데요. 그에 따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모들도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약 61%의 노인이 향후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현상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도입에도, 즉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은 이런 사회 현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 독거 노인이 연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위 사람들에서 의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 되었다는 뉴스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노인 소외 현상은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생긴 현상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그에 따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 정책도 시급하구요.



노인분들만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동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가난한 가정의 아이가 성장 후 어른이 되어서도 가난의 되물림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의 되물림'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 가정의 어린이'보다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가정의 어린이'가 생활이 더욱 어렵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의 기회, 생활고 등을 이유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며 향후에 계속 가난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아동복지 연구소에서 2009 년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 조사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을 받는 빈곤가구는 6.0%(아동 수 37 만 1 천명), 절대빈곤선 이하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는 2.3%(아동 수 16 만 9 천명), 절대빈곤선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는 3.9%(아동 수 24 만 1 천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절대빈곤선'이란?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질 문	정부지원을 받는 빈곤가정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정 (복지사각지대 중 극빈층으로 추정)
돈이 없어서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경험 이 있다	0.7 %	8.6 %
돈이 없어서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16.8 %	32.8 %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8.7 %	15.5 %
돈이 없어서 전기세전화세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3.4 %	8.6 %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7.3 %	12.3 %
연속 3개월 이상 건강 보험 미납으로 인해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2.0 %	17.5 %

※자료제공=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복지사각지대의 가구는 위에서 설명한 가난의 되물림, 그리 교육기회의 상실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하고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 제때 가지 못해 병을 키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는 생활고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로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 정도도 높다고 하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높인 아이들의 실태가 파악되어야 하고 분배 문제를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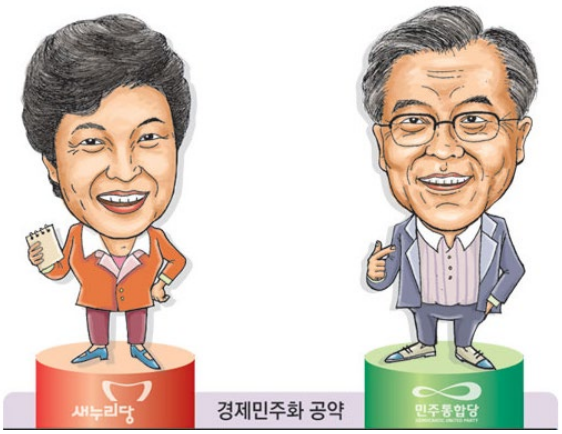


복지 문제가 대두화 되면서 주변 곳곳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도우려는 움직임도 많습니다. 이번에 전주시가 복지사각 소외계층 겨울나기 5 대 중점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5 대 중점대책이란, 난방대책, 위기가정 긴급지원, 한파대비 현장점검 강화, 노숙인 보호, 기부문화 확산 운동 전개이고 이를 통해서 서민들을 도운다고 합니다. 또 한파에 대비 차원에서 독거노인 8595 세대의 건강상태, 주택, 전기, 가스, 난방 등 결식우려노인 급식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점검이 이뤄지며 노숙인 보호는 전주역, 터미널 중심으로 리서치팀을 운영해 발견 시 노숙인 쉼터로 우선 입소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도움의 손길은 턱 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어린이 집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충과 여러 소외계층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낼 사회복지 직원들이 많이 고용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를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의 불합리성이 개선되어 2013 년은 소외되는 계층이 고통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⑥ 송민영(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이번 대선 공약의 집중 화두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러나 정작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각 당의 공약이 어떻게 다르고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선진화 연구모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그대로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경제의 주인을 국민으로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의 원인을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한국의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에 재벌들이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요즘 늘어나는 대기업 빵집과 대형 마트의 확산, 그리고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골목들을 차지하는 커피숍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생들과의 토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로빈 후드의 이야기와 같이 긍정적이고 교화적이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방학 내내 선진화 포럼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과 일치하여 특히 기억에 남았는데요.



로빈 후드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의적입니다. 여당과 야당 두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니 야당의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로빈 후드의 행동과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경제의 정의를 실현하자라는 점에 강점을 둔 것이 그렇게 느낀 이유인데요.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는 달리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대기업의 윤리성을 강화하자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대기업의 재벌들을 단죄하고 해체시키자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경제정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재벌들의 자식들이 일반 소시민들의 자식들과는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점으로만 미루어 보자면 부정출발,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출발선의 배경까지 들여다보면 과연 그 때에서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재벌들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대기업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어떤 기업이 경제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선택한 것에는 잘못이 있지만 선택된 기업이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한국의 위상도 더불어 올린 데에는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불만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면 과거의 국가중심적인 정책을 비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출발선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특정기업에 국가가 지원을 몰아주지 않았다면 말이지요. 또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면 말이지요. 그러나 그렇다면 저희가 나눌 파이의 크기는 매우 작아졌을 것입니다. 아예 파이가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재벌들, 우리의 오늘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이들을 심판하고 벌하는 것이 과연 경제의 정의를 찾는 것일까요?



이와 반대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재벌들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제재하는 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친재벌, 친대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당에서는 당연히 이런 솜방망이 공약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비난이 여론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지도 모릅니다. 새누리당의 구성원과 후원자들이 재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를 다뤄야 함을 알면서도 재벌을 해체시키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입장이 어떤지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어떤지 그들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계를 생각하고, 우리 나라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재벌이 해체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국가 브랜드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특성이 재벌 해체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게 하지 않으신가요?



무엇이 포퓰리즘이고, 무엇이 국민의 필요를 잘 반영해서 만들어진 공약인지의 경계는 그 공약의 실행가능성과, 그 공약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에 의해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2 월 19 일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심사 숙고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⑦ 유선미(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대통령은 동북아 안보협의, 중소기업을 내다보고, 경제위기를 위해 장기적 구조개혁을 하고,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일자리를 실제로 창출할 수 있는 분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각자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공약들을 내 건 걸까요? 실제로 선거 후 옮겨진다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잘 지킬 것인가?, 우리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을 하는 대통령입니다.

리더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리더의 사전적 의미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리더를 말하자면 항상 리더십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리더십은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적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으로 뽑을 리더는 소통과 토론을 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절대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의 일을 혼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상태를 혼자서 수습하고 바로잡으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과 같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저버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대선, 총선, 지역구, 심지어 학생회, 반장선거에서도 조차 후보자들은 유권자들과 소통을 원합니다. 자신을 어필하기 위함을 필두로 각종 공약과 자신의 신념, 의지와 추진력을 역설하는데, 그것은 후보자에게 끝나버린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당선이 되고 난 후 의례 생색내기 식의 간담회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발생하는 청문회, 그들은 대중보다 권력과의 소통을 지향합니다. 그들은 왕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리더입니다. 전국시대 제 나라 위 왕은 백성의 눈과 귀를 자처하며 세상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한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가진 자가 더 잘 사는 것이 법치이고, 부유함이 부유함을 낳는 것을 민주적이라 합니다. 어려울 때 고비의 순간을 나누는 것이 의리인데 유권자는 도통 의리가 없습니다. 그럴싸한 공약으로 눈 먼 표를 가져가면서 현안과 실정의 불일치를 이유로 입법 추진을 미룰 뿐이죠. 정권 말기에 생색내기 식으로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면서 문제 있는 쳇바퀴는 궤도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소통과 대화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시작은 정의의 구현이며, 진정한 의미의 정의는 결국 국민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대의를 위한 초심 그대로의 마음가짐을 유지한 채 한발자국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바랍니다. 知가 아닌 德으로 국민의 한숨을 덜어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⑧ 윤보라(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한민국 영화 르네상스 시대! 지난 9월 김기덕 감독이 제69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영화 ‘피에타’로 최고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데 이어, 영화 ‘도둑들’과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 해 두 편의 천만영화가 탄생했다. 게다가 올 11월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화 관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그야말로 한국영화 부흥기이자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올 한해 유독 ‘정치’를 다룬 영화가 많이 개봉됐다는 것이다. 올 4월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12월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일까? 정치인 혹은 정치적 사건을 다룬 다수의 영화가 극장에 올랐고 관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총선에 이어 대선을 앞 둔 국민에게 정치는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실정치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그래서일까? 현실에 실망한 그들은 영화 속 극화된 캐릭터를 통해 정치를 이해하고 대리만족하기도 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는다. 어떤 이는 정치적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를 보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상영 내내 펼쳐지는 가상현실은 관객들에게 '정치적 판타지'를 심어주거나 교육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는 2시간이면 끝이 난다. 2시간 동안의 '판타지'와 '교육'을 현실세계로 끌어낼 수는 없을까?

영화가 심어준 '판타지'를 현실로 끌어내려면 실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대선 후보들(이왕이면 모든 정치인들까지)에게 올 해 개봉된 두 편의 영화를 추천하고자 한다. 그들이 수 많은 관객을 웃고 울린 영화를 보고, 느끼고, 공감한 뒤 이를 현실 정치에 반영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화 〈댄싱퀸〉



황정민, 엄정화 주연의 영화 〈댄싱퀸〉은 올 초 개봉해 4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다. 이 영화에서 대선 후보들이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배우 황정민이 연기한 '정민'이다. '정민'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인물이다.

사실 그는 정치인들이 계획한 '정치 쇼'에서 '바람잡이용'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역이용해 정치판의 위선과 무능을 비판한다. 평범한 시민이었기에 일반 사람들이 안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정민'. 결국 그는 국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

이 영화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 기존 정치인들이 야합하는 모습, 권력 다툼을 하는 모습을 풍자하며 구태 정치를 비판한다.

국민과 소통하려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권모술수로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고, 소통도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공감하려는 의지와 진정성 있는 태도이다.

현재 대선 후보들은 입을 모아 소통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운 사람이 말하는 소통에는 진정성이 없다. 국민이 원하는 소통은 함께 웃고 울고 아파하는 공감대 형성이 동반하는 소통이라는 것을 대선 후보들이 알아주길 바란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천만 관객 돌파에 성공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이하 '광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광해〉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고 있으며, 대선 후보 중에는 문재인 후보가 〈광해〉를 본 뒤 눈물을 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다.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대선 후보들이 '눈치보기'에서 벗어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한 광해군을 대신해 왕좌에 올라 왕 행세를 하는 천민출신 '하선'. 그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선의 사정에 맞추어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를 펼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실용주의 정책을 통해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 중국 등의 눈치를 보느라 바빠 외교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영화 〈광해〉속 '하선'이 말한 것처럼 내 나라의 이익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을 생각한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이미 권력을 잡은 기업인, 정치인 등의 눈치를 보느라 아래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에 오른 것도 심화된 양극화에 울부짖는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를 실천해 1%가 아닌 99%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초 접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대선. 과연 어느 누가 영화를 통해 정치적 판타지를 키운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만 살펴본다면 누구 하나 흠 잡을 사람이 없다. 하지만 말로만 국민을 외치고, 소통을 주장하는 인물은 필요 없다. 감언이설로 표를 호소한 뒤, 당선 후에는 모른체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왕좌'에 오른 뒤에도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차기 리더가 되길 희망한다.

⑨ 이철우(청주대학교 무역학과)

여의도 한복판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의정부역 흉기난동, 울산 슈퍼마켓 칼부림 사건 등 최근 전염병처럼 '묻지마 범죄'가 퍼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아무 이유 없이 혹은 개인적 이유라고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의 자포자기형 분노 범죄입니다.



선진국들이 1~2 세기에 걸쳐 이뤄낸 경제성장을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이뤄냈으며 현재는 세계 10 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동경의 대상과 동시에 롤모델이 되었고, 선진국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우리내부에서는 암암리에 조금씩 문제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것이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역시 그 중 하나 입니다.

6.25 전쟁 후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은 철저히 개인의 생각과 권리는 무시되었고, 성장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장일변도의 정책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가 올 것이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국가 발전에 궂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국민은 소외되었고 정부의 혜택을 받아 성장한 대기업들의 물질적 풍요만 가져왔습니다.

과거 소수의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근무 환경과 대우의 격차로 인해 한정된 대기업의 일자리를 놓고 젊은이들은 서로 경쟁하며 중소기업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 등만 기억하는 우리사회 풍토와 더불어 사회적 차별, 고용불안, 회생의 어려움 등 불안정한 사회의 구조는 사람들을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자살 및 범죄 행위 등 극단적으로 사회에 표출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산업의 많은

노동력이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과 자동화 설비로 대체되고, 일자리는 자연스레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의료산업이나, 관광 산업 등 서비스산업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규제를 통한 강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실행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및 유능한 중소기업 인재 빼가기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젊은이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밑으로 떨어져 있는 빈민층을 위한 복지가 필요한데, 가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로 돌리고, 사회에서 일정부분 책임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규제와 중소기업 지원만으로는 빈민층은 스스로 중산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정책을 늘리고,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노력 역시 강조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보다 분명 좋은 조건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오늘날에 무조건 사회에 원인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며, 정부의 지원아래 본인의 능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각종 경제공약들을 제시하고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해보려는 공약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 부디 그 공약들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것들이 아닌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생각해서 내놓은 그리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공약이기를 바랍니다.

⑩ 장민영(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제 19 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토론 모습〉

요즘 대선 열기가 한창으로 뜨겁습니다. 대선 토론이 있는 날이면 사람들은 열렬하게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다들 누구를 찍느냐에 고민하지만 다들 찍을 사람이 없다며 고개를 젓는 사람이 많습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 투표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표가 死표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투표율만 올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내 표가 과연 내 권리를 표현하는 표가 될 수 있을까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기말고사 기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관심은 선거에 없었습니다. 학칙, 선거법에 의하면 투표율이 40%가 넘어야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43%가 넘어야 '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단대마다 투표소를 설치하고 아침부터 수업이 모두 끝나는 7 시까지 이틀 간의 투표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5 분도 걸리지 않는 투표를 할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경상대학의 단대 학생회장 투표는 연장도 되지 못한 채 보궐이 되었고, 총학생회는 연장투표를 하여 가까스로 개표를 할 수 있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총학생회선거 개표 당시〉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개표 당시 엄청난 무효표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효표가 투표를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후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동적인 표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표를 직접 참관하면서 기권표와 무효표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표에 무효를 하면서 말하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졌습니다. 때문에 후보자들은 이러한 무효표를 아까워 하고, 한표 두표가 아까운 상황에서 조금만 더 자신을 어필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총학생회 최종 개표 결과>

재적수(명부) : 6540명
투표인원(명부) : 3046명

	총 재적인원	총 투표인원	만사소통(득표)	새로고침(득표)	오차율	무효표	만사소통(득표율)	새로고침(득표율)
총학생회	6540	3046	1540	1382	0.23%	131	52.7	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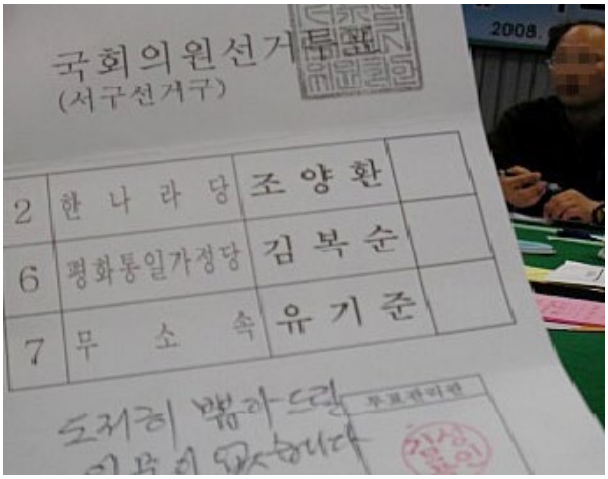
총학생회 만사소통 선본 박광원 정후보, 정재희 부후보 당선 유력
24시간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당선 확정됩니다.

〈총 투표인원이 3000 여명이 되는데 무효표가 100 표가 넘어간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총학생회 투표는 투표율도 높지 않았는데 무효표가 많다보니 사람들이 이러한 투표가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도 논합니다. 무효표가 너무 많아 의심스럽다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선거에 대한 불신도 높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대선이라면 제 1 당과 2 당의 독점을 견제할 만한 다른 당에 투표를 함으로써 이러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 당과 2 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제 3 당이 당선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당의 입지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학생회는 경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효표가 너무도 많아졌고, 투표율과 더불어 두배로 안타까운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총선때도 나타났습니다.

권리이자 의무인 자신의 투표권을 유권자가 너무 소홀하게 행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투표까지 어렵게 하러 와서 이렇게 무효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제대로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 광장에 나온 무효표 사례: 뽑을사람이 없다고 쓰여있는 투표용지〉

〈뉴스광장〉 리포터
"기표 칸을 벗어나 선에 걸쳐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 선거 막바지에 출마를 포기한 후보에게 기표한 유권자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무효표 역시 많습니다. 출마한 후보 모두를 찍고 보란 듯, 기표 칸 밖에 찍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기표 하지 않은 백지 투표용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무효 처리된 표는 72 만 2 천표를 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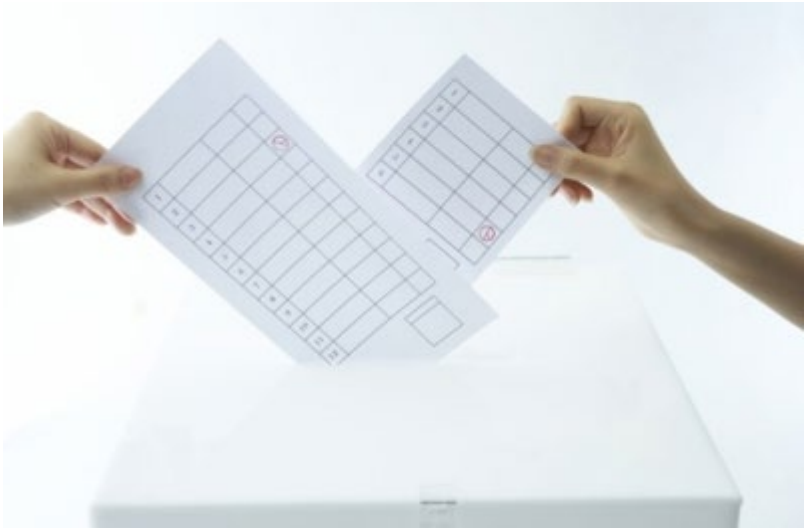
"지난 18 대 총선 때보다 23%나 늘었습니다. 일부 선거구는 전체 투표율의 12%에 가까운 9 천여 표가 무효처리 됐습니다. 수십·수백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선거구에선 선거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수입니다. 특히, 정당지지 투표에선, 무효표가 지난 18 대 총선 때보다 40%가량 늘어 난 47 만 4 천여 표가 나왔습니다. 20 개나 되는 정당이 혼돈을 일으킨 것이 이유지만,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로도 해석됩니다. "

투표는 독려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치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요. 젊은 사람이건, 아니건 투표는 모두들 해야 합니다. 무효표가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무효표가 정치적 무관심보다 정치에 영향을 훨씬 긍정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러한 무효표에 대한 자각을 하고 올바른 변화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2013 년은 밝은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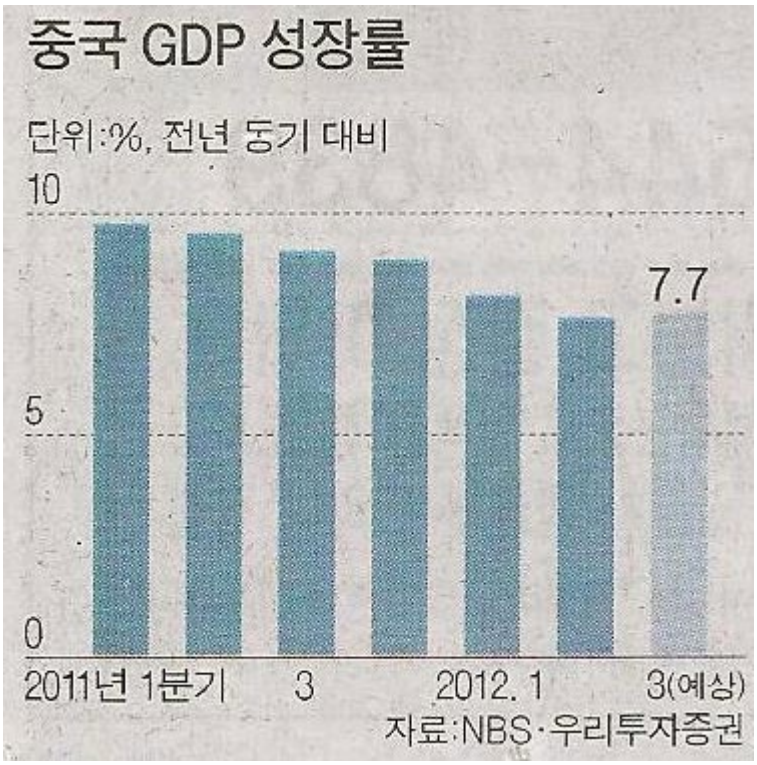
⑪ 황재인(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19 일 대선이 어느새 9 일 앞으로 다가왔다. 19 일이 지나면 주변 각 국의 대표자 선거는 끝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도 그에 발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 국의 바뀐 정권의 상호 간의 소통은 넓게 봐서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중요할 것이고 좁게 보더라도 당국의 이익에는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점에서 소통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시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우호적으로 국제 정세를 풀어나갈 것인가, 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외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국내의 상황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대한 민국은 다양한 국가와의 소통이 중요시 된다.

중국의 예를 보자.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군사력 증강을 살펴 보면 2011 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은 미국 다음으로 G2 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IMF 는 좀 더 정확한 수치로서 구매력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상할 때 2017 년경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 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고 한다.



군사력 증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스텔스 기술의 개발,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향상 및 항공모함을 추적하며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2003 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및 미국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있다.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은 또한 정책을 아시아로 옮기는 중이다. 중국의 성장과 그걸 견제하려는 미국 세력의 사이에서 한국의 국제적 줄타기는 아슬아슬하다. 대한민국은 전략적인 교두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양국 모두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략적 이익을 잘 고려하고 한미 동맹과 중국을 잘 고려하여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 국과의 소통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어떠한 국제적 상황에서도 대한 민국은 대화의 채널을 열어 두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적 안보를 공고히 하는데에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단 소통은 국제적으로 중요시 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중요시 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나라를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끊임 없는 대화는 핵심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과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존재하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은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소통'은 까다롭다. 국제적으로는 말할 수 있는 소통, 국내에서는 들으려 하는 소통을 원하고 있다. 또한 소통을 통해 설득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바란다.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설득시키는 지혜로운 대통령과 좋은 정책과 청렴하고 따뜻한 정치로 국민들의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바라는 바이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연구모임 제 4 차 주제는 한국선진화포럼의 제 70 차 월례토론회 주제『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보고 한층 더 심도있는 대학생들끼리의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월례토론회를 보았지만 토론 당일이 대선 토론의 다음날이었기 때문에 대선 토론에 관해서도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주제보다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집중한 토론 과정이 주를 이루게 된 마지막 선진화 연구모임이었습니다.



장민영(북한 3) :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10 학번 장민영입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은 차기 대통령에게 대학생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환훈(사회 3) :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고 국회도 다수당이면서 지금 내걸고 있는 공약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공약과 반대되는 법안들을 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건 공약은 포퓰리즘적인 보여주기식의 공약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재욱(북한 3) : 저는 청년실업문제 두 후보 모두 일자리 몇백 만 개를 창출한다지만 모두 단발성인 일자리에 그치고 있고 일자리가 지속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모두를 정규직화하면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낙수효과를 보기 위해 저금리 정책으로 대기업을 키워주었는데 이제는 대기업이 얻은 이윤으로 실질적인 낙수효과를 봐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직원채용과 하도급업체의 일자리 늘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로 일자리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하청업체, 벤처기업들이 직원을 더 채용하게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는 차원에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이나 보조를 할 지 묻고 싶습니다.

장민영(북한 3) : 기업과 서민 모두의 입맛을 맞추려다 보니 애매한 공약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이재욱(북한 3) :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화해서 4 대보험이나 노조설립같이 기업에 해가 되면 안되니까 정부차원에서 알선해준 직원들은 노조가입이나 파업등 반기업적 행위를 못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싸지는 것들을 방지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대신 4 대보험은 가입시켜주는 그런 조건으로요.



전아영(북한 3) :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둘 다 이전 정부들의 정책들을 재탕, 삼탕하고 있는 형세라 진짜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후보들이 과거의 정책들만을 답습하고만 있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이들의 공약을 “먹튀공약”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단 뽑아달라고 호소한 뒤,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난 뒤에는 나몰라라 할 공약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책들을 그대로 발표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전초희(독문 3) :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유세기간에만 공약을 외치고 다니지 당선이 되고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실현가능한 정책,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정책,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나눈 다음에 시작한다고 하더라구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뻔한 이야기고 실현 불가능으로 치부해 버릴 정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신뢰를 운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고 후보자들이 공약을 다 지킬거라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전아영(북한 3)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고령화'문제와 '저출산'문제, 그리고 '실업문제'의 해결법 제시입니다.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라고도 할 수 이는 사인들 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해결법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학도로서 후보님들에게 바라는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원칙을 가지고 이를 유지하되, 유연함을 빼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너무 매몰찼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으며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저는 어쩌면 이전 정부들이 펼친 대북정책과 북한의 태도,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면국들의 정세를 통틀어 흐름상으로 보았을 때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강경정책은 옳았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유연함은 없이 너무 채찍만을 북한에게 가한 것이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일관되고 원칙적인 정책을 유지하되, 유연함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슬기(영문 3) :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문재인 후보께서 내놓으신 공약들 중에 “동물보호에 대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입니다. 동물들도 인간과 같은 생명이라는 점에서, 생명에 대한 중요도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충격적인 동물 학대 사건들이 발생 할 때마다, 국민들은 그때만 분노하지 시간이 지나면 다들 새까맣게 잊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 누군가의 조롱거리로 고통을 당하고 결국 목숨마저 잃은 동물들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허무하게 잃은 주인들의 아픔은 또 어떡합니까? 이러한 점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강력하고 공식적인 법 제정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유나(북한 2) : 저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사항에 대해 안보적인 관점에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서해에 공동어로 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최근 NLL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지 궁금하더라구요. 북한학과이다 보니 NLL 에 대해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공약이 북한에 트집이 잡히지나 않을지, 평화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사항일지 의문이 들었어요.

장민영(북한 3) : 맞습니다. 특히 NLL 은 북한도 공식적으로 신문에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를 어긴다는 명분하에 도발을 할 수도 있고 심각한 안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문제도 중요하지만 안보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우리나라 국군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민감한 NLL 에 대한 성급한 공약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민(고고미술 4) : 저는 이번 대선후보들이 반값등록금이나 교육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결과만 있지 그것을 위한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에 전아영 학생이 말했듯이 항상 말해왔고 모두가 원하는 공약들만 넘쳐납니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창의적인 공약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하는 후보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재천(중국 2) : 저는 공약들을 훑어 보고 대학생들이 느끼기에 그냥 정당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엔 말하는 건 이상적인 이야기들 뿐이며 정도의 차이 라고 느껴졌거든요. 물론 복지에 대한 정도의 차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정도의 차이가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이상적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도 우리들의 생각이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사람의 리더쉽이나 객관적인 면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면이나 됨됨이를 더 많이 보기 때문인 경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점점 투표율이 낮아지고 민주주의가 우민화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기도 해요.



장민영(북한 3) : 네. 각자 이번 대선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거의 두 후보자들에 대한 생각이 주를 이루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첫 대선 투표권을 갖게 된 만큼 너무 떨리고 그만큼 신중하게 투표를 하고 싶어요. 때문에 이런 토론의 자리가 너무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후보자들 공약도 중요하지만 투표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혁신을 많이 외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싶은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투표를 해준다면 정말 정치가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 바쁘실텐데도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②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12 월 7 일, 제 18 대 대선이 12 일 남은 시점에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 학과 학생들이 학생회관에 모여서 새 대통령에게 대학생으로서 바라는 점에 대하여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외교, 경제 그리고 교육에 중심을 두고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진행자(디지털미디어 2 학년 황재인) : 안녕하세요. 시험기간을 앞두고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8 대 대선이 12 일 남았는데요. 지난 월례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아시겠지만,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여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월례토론회 동영상을 시청하고 연구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진행자: 남덕우 이사장님의 말씀을 비롯하여, 많은 원로 분들이 외교와 경제 또는 교육에 관하여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와 닿았던 부분이나 원로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T 자형 인재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국가와 개인에 대해 이익을 줄 수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임하자'라는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님이 제시해주신 인제상에 대한 답변이 공감됐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땠나요?

박대윤 : 저는 전체적인 토론 부분보다는 경제, 외교, 교육 등의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선 경제 부분은 기업의 자율 규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재벌 개혁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시겠다는 의견과,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한 원로님께서 자율규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조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과연 자율 규제가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인센티브라지만 대기업들이 그 인센티브를 잘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한 기업이 나왔을 때 다른 기업이 인수하지 않게 하는 규제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 규제만으로 과연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전다애: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기업의 규제강화를 하면 안된다는 생각과 삼성과 현대 없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생각에 반대하는 이유는 인정하긴 하지만, 짧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걔네가 무너져버리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그들을 누르고 없애려는게 아니라 그 기업에 맞출 수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역할이 축소되고 따로 규제되어야 중소기업 등이 비집고 나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언제까지 항상 위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없어선 안된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그 대기업들이 무너지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기업들의 성장을 마구 지지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놓는게 중소기업들과 대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윤: 그런데 또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기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큰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한번 규제를 하게 되면 적당한 규제나 어느 정도의 규제가 과연 될까요? 규제를 하다보면 손도 끝도 없이 대야 할 정도로 규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맞추어 대기업을 규제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도 결국 대기업의 하청을 통해서 성장하는 건데 그런 대기업을 규제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규제한다는 것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요.

민병현: 왜 중소기업이 하청만을 받아서 성장한다고 생각해? 종합적으로 봐야지 하청만으로 살아간다는건 조금 좁게 보는게 아닌가?

박대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 대기업이 망한다고 생각하면 그 아래에 기업들도 마찬가지니까.

전다애: 내가 말하는 규제를 해야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대기업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본질적인 의미가 다르게 다가갈 것 같아요. 대기업의 성장을 막기 위한 규제냐 아니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냐.



박대윤: 너무 무리한 하청이나 담합 등이 중소기업의 문제가 된다는 거에요. 그 이외의 대기업의 역할로써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 또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방향이라면, 일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구요.

진행자: 너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 쪽으로 바라는 새 대통령에게 우리가 바라는 점은요?

김강민: 개인적으로 본 실질적인 큰 두명의 후보는 결국 재벌 개혁을 해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명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하는가는 두 후보들의 세부적인 공약을 잘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항상 후보들이 얘기하는게 너무 둥그스름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 어떠하게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후보들의 공약이 더 구체적이고 어떠한 정책과 실행을 통해 재벌 개혁을 이루고 그것을 경제민주화를 통하게 할지, 그것이 경제분야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바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선거를 행할 때, 예를 들면 서민층의 입장에서 재벌 개혁을 할건지, 아니면 재벌 기업의 입장에서 개혁을 통할 것인지 그것을 잘 알고 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후에는 그것을 지켜줄만한 후보인가를 알 수 있는 그들의 정치 태도 등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진행자: 예전에도 이야기 했던 내용이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정확한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뭔가요?

민병현: 다 같이 살자는게 경제 민주화입니다. 양극화가 너무 큰 이시점에 지금은 그 중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다애: 저는 민주화에서 중요한게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개념을 저는 약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절대 민주화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경제적인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지라도 경제력을 갖출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경제 민주화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박대윤: 다애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건데, 이미 아래를 위해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직도 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R&D 가 너무 약합니다. 제조업과 유통업 쪽에만 투자하지 말고 개발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딤채와 같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기술과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대기업이 없어도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미 대기업은 아래를 위해 힘을 실어주도록 어느 정도는 경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어요.



진행자: 경제쪽으로는 결국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애기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그대로 성실히 실행시켜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성실한 태도도 알고 투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외교를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외교에 대한 여러분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 이라는 부분에 키워드를 두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민병현: 가까운 북한에 대한 '소통'은 어떨까요. 지난번 동북아 정세 이야긴 너무 어려워서..(웃음)

박대윤: 저는 북한에게 항상 이렇게 나가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개발비용을 중국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요. 중국이 언제까지 북한을 좋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결국 우리에게 언젠가 손을 뻗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북한에게 소통을 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 달래듯이 하는데, 그것이 옳은가 생각합니다.

전다애 :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그러다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에게 손을 뻗치고 기대려 하는게 아니라 완전히 등을 지고 전적으로 중국에게 기대려 한다면 어떨까요?

박대윤: 북한이 중국에게 흡수된다는 것 자체가 주변 국가에게 위험성이 강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진행자 : 북한과의 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너무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정말 구체적인 소통을 하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병현 : 결국 현재를 체제를 유지하여 소통할 것인가, 바꿔서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는건데, 북한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겠죠. 너무 크고 아까 말한 대로 '둥그스름'한 이야기일 뿐이지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동영상에서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원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 또한 역시 바라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박대윤 : 도발은 하지 않되 평화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잘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민: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소통을 유지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예를 통해 '그들에 대해 어떠한 소통을 이루어야 하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어떤 다른 나라와도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말할 것인가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략적이익을 잘 고려하되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관계를 잘 고려해서 서로 충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외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셨었는데, 그것에 동의합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정말 당연하지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 항상 모든 나라와의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고 대화를 하려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저희뿐만 아니라 당연히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입니다.

민병현 :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교육과 대학교육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학교에서는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어떠한 진리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의 초,중,고 교육이 뭔가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심하게 반영된 교육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배우는 아이들이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적성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배우는 아이들은 그것이 국가가 안에 담아둔 좁은 교육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더 넓게 보고 알 수 있는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민 : 터무니 없지만 개인적으로 솔직히 시험 폐지가 이뤄질만한 교육정책이 나올 것을 바랍니다. 외국에서는 취업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학문을 이어갈 사람들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시험폐지'라 얘기했지만 서열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내린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시험으로만 어떠한 사람을 평가 내리고 인재상을 만드는 것이 어떤 능력과 잠재력을 가질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가능할까 생각했습니다.

박대윤 : 저는 시험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기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계열을 나누는 것처럼 그전 초, 중, 고등학교때는 원하는 희망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대학교때는 정해진 것에 대해 더욱 심화된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수능과 같은 획일화된 시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뭔가 자신들만의 특성화된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대졸에 대한 필요성을 두는 것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 지식들이 필요한 직업들은 물론 대학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학 안에서 배우는 것을 통해 일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또 그것이 그들이 당연하게 요구할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모든 직업에서 대학 교육의 완성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되버린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육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진 교육에 대한 사상이 바뀔 수 있는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적성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요.

진행자: 요하지 않은 직업에는 불필요한 교육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입장은 어떠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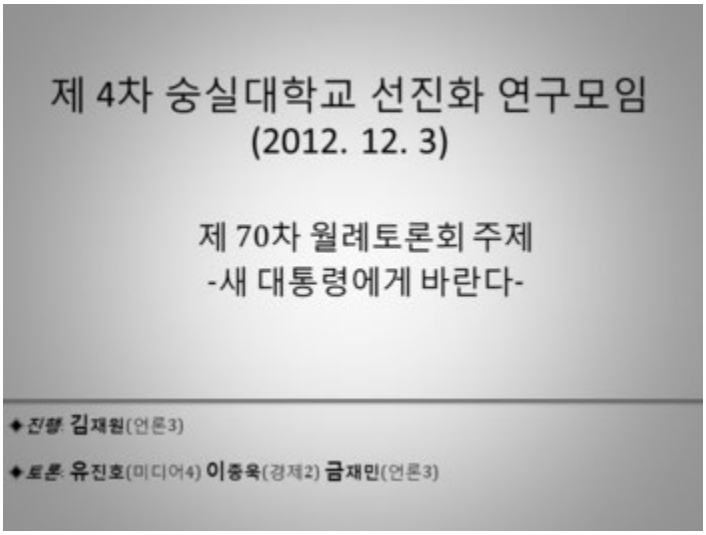
전다애 : 교육정책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들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강제적으로 가르쳐주는 입장과 상황이 생기기 전에 개인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무언가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을 가질 수 있는, 또한 그것이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그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배워가는 필요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기본 바탕이 되는 사상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사상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이요.

김강민: 세계에서 가장 독립심이 낮은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조금 버거운 얘기인거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도 모두에게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를 가르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교육적으로의 정책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을 구분짓고 나누는 정책을 만드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전에 배경이 되는 '배우려는 자세'를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자신의 원하는 것을 스스로 배우려 하고, 미리 그 적성을 알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비효율적인 공부만을 무작정 권하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미리 원하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저 또한 동감합니다. 강제적인 주입, 현재의 교육처럼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토론문화가 발달한 해외처럼 자신의 생각에 논리를 더해가며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무궁무진하게 깊게 알아가고 또 생각을 나누며 여러 이야기를 배움으로써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번 월례토론회와 연구모임에서 느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③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오는 12 월 19 일에는 제 18 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제 70 차 월례토론회 주제인<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를 통해 이번 숭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연구모임 멤버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 나아가 국가의 모습을 논의해봤다. 또한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인 '경제민주화'와 '소통과 통합'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을 논의해봤다.



〈토론 전문〉

진행자

대선이 며칠 안 남았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먼저 이야기 부탁한다.

금재민(언론 3)

나는 말이 통하는 대통령, 그리고 젊은이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대통령을 바란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게 요즘의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는 젊은이들은 비 기득권층으로 볼 수 있겠고, 고소득 가정의 자녀가 아닌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젊은이들에게는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희망과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기존 보수 세력은 원래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같은 방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본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약자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의아함을 낳는다. 결국 청년을 대표해줄 정당은 사실상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을 대변해주고 희망이 되었던 이가 있었으나 대선 판에서 볼 수 없게 돼 아쉽다. 나는 비 기득권층의 청년들을 대변해주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자질과 비전을 가진 대통령을 바란다. 또한 국가의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그런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때로는 우직함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귀를 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줄 알며, 옳은 방향의 정책을 선별하여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유진호(미디어 4)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공감하는 바다. 또 한편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바른 정책을 고민하는 대통령이다. 정치인이 신경 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책이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 선거판을 보면 점진적으로 하겠다며 당장 본인들은 어렵진 않으니 그럴듯한 수사법과 현실적인 문제만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또한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먹고 살 문제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좀 근본적인 고민이 선행되고, 이후에 그런 고민이 담겨져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금재민(언론 3)
공감한다. 덧붙여 말한다면 일자리는 사실 적지 않은 것 같다. 문제를 말하면 직업의 귀천에 대한 인식이라고 본다. 즉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은 대단하고 어떤 직업은 그렇지 않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런 현상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앗아간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종욱(경제 2)
내 의견도 앞서 두 학우가 말한 의견들의 연장선상인 것 같다. 기득권. 언제부터인가 이 말은 우리사회의 암흑 같은 용어가 됐다. 기득권을 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기득권을 쥐지 못한 자들은 사회의 패배자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바라는 대통령은 과감하게 이러한 기득권 사회를 타파할 수 있는 모습의 소유자이다. 얼마 전 SBS 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최후의 제국〉을 시청했다. 자본주의의 맹점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맹점의 해결책을 나타내고 있다. 기득권이 다른 게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기득권이다. 사회적 명성, 지위 역시 그렇다. 하지만 돈이 점점 위대해지고 있는 시대다. 그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라는 진부한 시장논리는 그만 좀 주장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대통령이 과감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는 대통령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용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금재민(언론 3)
센스 있는 대통령을 바란다. 쓸데 없는 정책을 실시한다거나, 실효적이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통령말이다.

진행자
다들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하다. 방금 쓸데 없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언급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쓸데 없는 정책은 없는 것 같다. 즉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에 앞서 그 동기와 목적은 분명 나름대로의 방향성과 전체적인 이익 및 편의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만약 이 마저도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정책을 실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언급됐던 우직함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우직함이 변질되면 고집이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법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중간에라도 보완되어야 할 점이 드러나면 그것도 국민과 여타 전문가들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리더라는 것이 무조건 끌고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제를 바꿔보겠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번 대선의 핵심적 이슈가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이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과 또 그 근거를 함께 설명 부탁한다.

이종욱(경제 2)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민주화라는 개념이 경제에 덧붙여질 수는 없다고 한다. 또한 기업의 경우 본래 존재하는 목적이 이윤창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바로 양극화라는 질병이다. 경제가 아무리 인간의 이기적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공동선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본다면 시장경제논리와 이기적인 인간의 경제 행위는 단지 하나의 경제적 관점으로만 봐야지,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것만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바른 길로 갈 것이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애초에 없는 말을 만들면서까지 핵심 의제로 나타난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사회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진행자
얼마 전 EBS 에서 방영되었던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봤다. 그 다큐의 5 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편을 보면 사상가에 대해 이렇게 다루고 있다. 경제를 놓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는데, 케인즈의 경우 큰 정부를 주장하는 반면 하이에크나 아담 스미스는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득권을 쥔 자들은 그리고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아담 스미스와 하이에크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라고 운을 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에서는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한 건 작은 정부가 맞다. 그러나 작은 정부는 무(無)정부가 아니다는 것이다. 즉 시장에 개입해야 할 때가 있다면 언제든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시장논리와 그 효율성은 지금의 승자독식, 재벌독식이 계속되는 것을 마냥 지켜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해설자는 이렇게 되묻는다. “아담 스미스와 하이에크가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라고 말이다.

유진호(미디어 4)
나는 무조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이클 샌델의 책을 몇 권 읽었다.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공이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본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샌델이 말하는 주요 골자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사회적인 도움이 없는 개인의 성공이 과연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스티브 잡스이다. 잡스가 아프리카에서 아이폰을 개발했다면 지금의 아이폰만큼 보편화되었을까. 그렇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이런 논리로 보면 좋을 것 같다. 대기업과 재벌의 성공은 비단 그들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국가의 친 재벌적인 정책들도 있었고, 소비를 하는 국민들이 있었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돼 있었던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 중심의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만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적인 성장이 진행되면서 국가의 이미지는 올라갔을지 몰라도, 또 가진 자들이 말하는 ‘국격’이 상승됐을지 몰라도 정작 내부 사정은 대외적 이미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결과를 낳았다. OECD 가입 국가 중 자살률 1 위, 빈부격차 심화 등 국가의 존재 가치로만 본다면 정말 무의미한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재민(언론 3)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부의 약 51%를 차지한다고 한다. 중국도 비슷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구조가 과연 경제민주화를 외면해야 하는 구조일까.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현대와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는 인식을 갖고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 기성세대는 전후시대를 살면서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본을 받을 분들이 있는 반면 지금의 정치를 하는 혹은 상위층에 속하게 되어 가진 부를 움켜쥐고만 있으려 하는 논리는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하다. 그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북한의 세습구조와 무엇이 다른지. 그들이 북한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는 그 용어 자체에 국한 지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마음과 사회를 위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행자

경제의 주체는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민주화라는 평등적 의미의 개념이 가미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도덕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간은 도덕을 갖춰야 하는 존재다. 그러한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적인 이기심만 놓고 보는 건 옳지 않다. 도덕을 갖춰야 비로소 올바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나는 마이클 샌델을 좋아한다.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좋아한다. 공동체주의자로 불리는 그는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고 묵인하는 공리주의가 아닌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힘쓰자는 공동체주의를 주장한다. 나는 시중에 있는 그의 저서(〈민주주의의 불만〉, 〈정의란 무엇인가〉,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왜 도덕인가〉)를 모두 읽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꼭 한 번 읽어보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제 화제를 바꿔 소통과 통합의 대통령, 소통과 통합의 국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 지어보고자 한다. 소통은 참 어렵다. 마찬가지로 통합도 참 어렵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기 위해선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지 의견 부탁한다.

유진호(미디어 4)
소통은 최근 들어 이슈가 됐다. 시기가 맞물린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단절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동시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소통이 화두가 된 것 같다.

진행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페이스북을 시작하셨다. 국외로 순방을 가서 사진을 올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단편적인 소통에만 신경을 쓴 것 같다.

유진호(미디어 4)
맞다. 그건 너무나 형식적이고,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소통이 정치에 비로소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서울시민은 아니지만 그런 정치인을 헤더(header)로 두고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본다. 박원순 시장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시민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인다. 또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왜 하는지를 투명하게 말한다. 그것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말이다. 4 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정권은 왜 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그게 뭔지부터 제대로 알려야 했고, 그 피드백을 더욱 수렴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금재민(언론 3)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소통과 통합의 전제조건을 나는 마음을 여는 데 있다고 본다.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치인을 비롯한 기득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이번 대선 후보 중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후보 역시 그런 면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소통과 통합은 그들만의,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열지 않고 자기네 목소리만 말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소통은 영어로 communication 이다. 접두어 'com'은 '함께'라는 뜻이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조차 아는 이런 의미(소통)를 그들은 모르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소통과 통합을 들으니 야권 단일화 과정이 생각난다. 안철수 씨가 사퇴하는 과정을 보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아쉬움이 크다.

이종욱(경제 2)
소통과 통합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그 주체와 범위가 중요하다고 본다. 박근혜 후보는 통합을 과거 김대중 정권의 인사와, 비 박근혜 인사를 끌어 모으는 그들이 말하는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는 통합을

중요시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대통합을 이루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 하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주체에는 국민이 있다. 국민과의 소통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통합의 경우 역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진행자
다들 너무 좋은 의견들 말해줘서 고맙다. 대학생은 스펙 쌓기와 아르바이트를, 직장인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느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쓰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관심 갖고 귀 기울이면 국민이 선출하는 지도자에 대해 비난과 비판은 한결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먹고 사는 문제의 연장선상 혹은 그 근본이 바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준 여러분은 대단히 변화를 갈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역시 동일하다. 그러한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후보, 정당이 없을지라도 다시 한 번 무엇(투표여부)이 더 현명한 것인지 생각해본다면 투표를 하는 것이 결국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 학기 동안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협조해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숭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각자가 바라는 대통령과 국가의 모습에 대해 의견을 나눠봤다. 특별했던 점은 핵심 의제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에 입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바로 양극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려는 국가의 움직임은 안 보이고 양적인 성장만 강조하는 국가의 모습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계파와 이념의 통합도 무시할 수 없지만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부분에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꼭 투표는 하겠다는 결의를 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④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민숙희(영어 3):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눠 볼 주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 투표를 하실 기회일텐데 그런 만큼 바라는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제 1 차 대선토론 보셨나요?

정경하(경제 1): 네, 전 처음으로 대선 토론을 보았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적이긴 했어요. 앞으로 남은 토론도 꼭 볼 예정이예요.

홍지희(중국통상 2): 이번 토론은 정치, 외교, 안보 등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나눴는데요. 다음 대선 토론이 기대될 만큼 흥미로웠지만 공격하기에 바빠 주제에 벗어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숙희(영어 3): 네, 여기 저기서 이번 제 1 차 대선토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과 비판하는 말이 많습니다. 아직 토론은 더 남아 있으니까 각 후보들께서 준비를 잘 해 오셔서 좀 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2 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각자 어떤 점을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지 편하게 말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민영(영어 1):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하면 제일 꼽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이번 대선토론에서도 국민들이 정치에 가지고 있는 불신에 대해서도 한 국민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전 이제 1 학년이긴 하지만 완전 그 질문에 공감을 했어요. 학교 회장도 선거공약을 안 지키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손명희(영어 3): 저는 복지정책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정치하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복지하면 망한다고들 하는데 예를 들어,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갖고 그리스가 복지정책을 펼친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 복지제정으로 나온 돈을 이익집단이 부정부패로 이용한 것이잖아요. 즉, 진짜 복지 비용이 국민들에게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복지하면 안 좋다는 인식이 많은데 새 대통령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깨우쳐 주고 적극적으로 복지를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서경(영상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민숙희(영어 3): 네. 주위에 둘러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와 반대인 사람들도 너무 많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그 중산층이 어려워져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구요. 다른 의견은요?

홍지희(중국통상 2): 최근에 성추행, 아동 성범죄 등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성범죄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평균 형량이 10 년 5 개월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형량은 일반 성폭행범의 경우 3 년 2 개월, 13 세 미만 대상 성폭행은 5 년 2 개월 정도라고 해요. 평균 형량이 3~5 년에 불과한 것이고 그나마 성범죄자의 절반 가량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하니깐요.

민숙희(영어 3): 성폭행범에 대한 기소율과 양형 기준을 대폭 높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시군요.

조민주(독일 2): 저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분명 기회 평등을 실현하겠다. 사교육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결과를 보면 사교육이 더욱 심해지고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교에서 성적을 받기 힘들 정도예요. 사교육 중심을 공교육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김설(영어 3): 저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요. 입학사정관제도 자체도 특목고 아이들이 차지하고요. 사교육도 돈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받는데 보통의 중산층은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뒤쳐지기 않기 위해 사교육을 힘들게 받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결국 학교 성적에서 뒤쳐지게 되고 교육 정책이 공교육 중심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손명희(영어 3): 교육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도 지방대학이잖아요. 이런 지방대학은 지방에 훌륭한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즉,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은 지방이 살려면 지방대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예요. 하지만 지방대학의 현실은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취업률 저조로 지방대학 학생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지방대학에 대한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사회적 편견이 지방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역발전과 재학생들을 위해서 지방대 재정지원과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서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해든나라(영상 1): 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지금 분명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이고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대북정책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대북지원이 중단되면 그 대응으로 테러 같은 공격성을 보이고 결국 그 도발로 우리나라의 국민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대북관계에 대해 무조건 달래기 식은 옳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민숙희(영어 3):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모두가 중요하고 요즘 대학생들과 젊은이들 모두가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있는 만큼 누가 뽑히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줄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네요. 첫 투표권을 가지게 되신 만큼 잘 생각해 보시고 신중한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시험기간이시라 바쁘실텐데 오늘 모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⑤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2012 년 11 월 27 일에 원광대 학교 선진화 연구모임 학우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 대통령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 시점에서 학우들은 열띤 토론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공약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실현이 가능한 공약인지를 논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민주화, 법과 질서에 대한 문제, 일자리 창출, 통일과 안보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유선미(신문방송 3):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의 주제는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입니다. 제가 이번 70 차 월례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대학생들과 원로들이 각자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에 원광대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자, 이번 토론은 현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실현 가능한지를 분야별로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대학생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바라는 점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혜(신문방송 3): 경제민주화에 대한 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문재인 후보는 경제주체인 노동자, 기업, 소비자, 국가의 시회협약추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재벌의 과도한 경재력 집중 완화를 위해 담합, 납품단가 부담인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엄단한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박근혜 후보는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공정성을 간과한 측면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시장의 불공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기 동안 균형성장과 수도권-비 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등이 균형적으로 성정하기 위해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미성(정치외교 3): 네 저도 이 공약을 봤는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우선 말로만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리고 사용자측과 근로자 측의 상생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비 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을 만들고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창희(국어교육 4): 경제민주화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굳이 잘살고 있는 사람을 못살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순환출자를 통해서 부를 증식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이 늘어날 뿐입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순환출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입니다.



박예슬(신문방송 3): 지금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시고 있는데, 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제민주화에 참여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미(신문방송 3):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 가요?

박예슬(신문방송 3):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차순영(군사학부 3): 그렇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기업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할까요? 인센티브라기보다는 **advantage**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로는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보균(신문방송 2): 그런데, 먼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한 다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압력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희(국어교육 4): 경제민주화든 복지든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남보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다같이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의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초, 중, 고 대학교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있습니다. 공약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것에 문제는 국민이 가만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우(소방행정 4):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복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자는 선택적 의료, 문재인 후보자는 보편적 의료로 무상의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두 후보자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들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 보험금이 인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30 대는 돈만 내고 쥐꼬리만한 혜택을 받을 것이고, 40 대는 부모 부양하면 혜택이 커집니다. 50 대는 고소득일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습니다. 60 대는 돈 조금 내고 혜택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미성(정치외교 3): 현재도 하고 있지만, 차등의 비율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선택적 의료와 문재인 후보의 보편적 복지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마련이지만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복지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과 스스로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잇는 사람과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세금을 낼 능력에 따라 기준을 확실히 하여 차등적으로 세금을 걷고 차등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보균(신문방송 2): 그런데 차등의 비율을 조금 더 늘리면 반발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성(정치외교 3): 네 물론, 반발이 예상되지만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형(법학과 3):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무료로 하게 된다면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나이를 많이 드신 분입니다. 자기 소유의 집은 아들이름으로, 재산은 다른 명의로 해놓으십니다. 소득 제로에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수해는 많이 받습니다. 이런 기형적은 구조를 서류상으로 보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구조사 하듯이 4 년에 한 번 정도는 실제 조사를 나가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파견을 나가서 조사를 한 후 과태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분이신데 서류상으로 미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에 손길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이 고루고루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미(신문방송 3): 마지막으로 대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새 대통령들에게 바라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소방행정 3): 저는 솔직히 대선후보자들이 말하는 공약을 믿지 않는 편입니다. 대학생으로서 가장 절실한 공약은 바로 반값 등록금이지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여 이루어졌다 한들 까다로운 서류전형과 알 수 없는 선발방법으로 지극히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장학금이 이루어지는 국가장학금은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 지방대학에서는 등록금 인하가 2%가 되어 이만 원을 돌려주는 것 마저 이러한 공약이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출마자들 중에서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 국민자살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이 자살하는 것보다 반값등록금이 더 중요하다 여기며, 부모세대의 자살보다 무상보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떻게 할 것이다 내세우는 방법보다는 그에 밑거름 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여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정치인과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현군 (신문방송 2):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고,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을 개서시켜주면서 앞으로 취업을 할 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통령, 청년들에게 창업지원을 많이 해주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만이 아닌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대통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최지혜 (신문방송 3): 대선 투표의 날이 다가올수록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누굴 뽑을지 가장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후보들은 당연 투표를 받을 수 없고, 대통령이 될 수도 없습니다. 민심을 받아야 그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듯이 서로 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이지만. 그 전에 공과대학을 다녔을 때는 학생회비를 걷어서 어떠한 곳에 쓰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통계적인 말이 없고, 오히려 학생회장이 되면 뒷돈을 받을 수 있다거나 남는 돈을 가질 수 있다 등 학생회장의 타이틀을 그저 돈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대학에서는 게시판에 이번 달 예산 목록을 적어놓고, 학생들에게 공개를 시키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지 않은 돈이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공대를 다닐 땐 그런 이야기만 듣고 학생회장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봤다가 지금은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이미지로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숨겨진 사건과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정치인, 대통령과도 소통할 수가 없고, 믿음과 신뢰마저 잃어버린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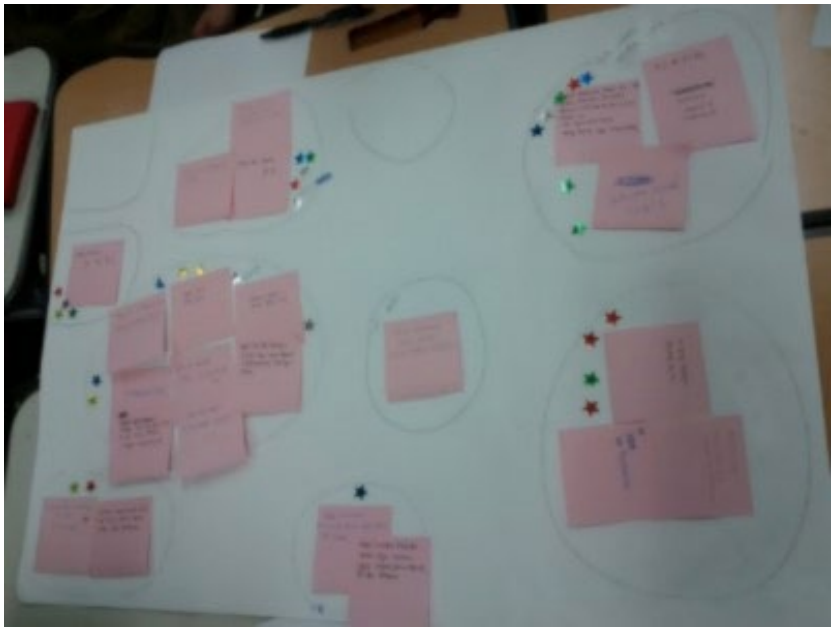
이번 대선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유선미(신문방송 3): 네,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가능하고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12 월 19 일 국민들의 손으로 뽑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⑥ 경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지난 12 월 3 일, 경기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 학생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바로 제 70 차 월례토론회에서 다루었던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이었는데요, 이제 3 주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취업을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고, 이상을 생각하니 현실의 벽이 가로막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현 대학생들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해경(국관 2) : 날도 추운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 특히 이번에는 우리 12 학번 친구들도 참여해줘서 유종의 미를 걷는 것만 같다. 이번 달 주제는 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관한 것이야. 12 월 19 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게 되잖아? 현재 후보로 있는 문재인 후보든, 박근혜 후보든 아니면 그 외의 다른 후보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선출될 텐데, 그 당파에 관계없이 대학생인 우리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 각자의 의견을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함께 자유롭게 나눠보도록 하자.



권예주(국관 1) : 저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썼는데요. 차기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지원도 하려면 인민들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정해경(국관 2) : 사실 우리가 지원해주는 물자나 식량을 북한 인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용도로 쓰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들 하지. 그렇다면 예주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권예주(국관 1) : 정확한 제도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한 정부는 너무 회유책만 쓰고 정부가 바뀌면 또 강경으로 바뀌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강경과 회유책이 공존하고 식량지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생산물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남북합작의 식량기구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정해경(국관 2) : 그렇구나, 민섭이는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거야?

김민섭(국관 1) : 저는 복지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요. 요즘 보편적이다 선별적이다 말이 많은데, 그 방법론이 어떤 것이든 단순히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더 많은 국민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지정책을 세우면 좋겠어요.

정해경(국관 2) : 복지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 누구하나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면 큰소리가 나는 법이니까. 기현이는?

박기현(국관 2) : 나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민과의 소통은 기본이고, 정부안에서의 소통, 당파끼리의 소통, 당내에서의 소통,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거잖아. 하지만 중재자의 역할을 대통령이 맡음으로써 또 자기만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음으로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해.

또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듯한 대통령이 필요하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국가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어. 튼튼한 국방도 챙겨주면 좋고 여지껏 우리는 권력의 비리, 정경유착 등 이런 문제들을 접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정치에 질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투표율도 낮아지잖아?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부디 뉴스에 나쁜 소식을 조금만 보여주면 좋겠어.

김아리(국관 2) : 나도 기현이 말에 동의해. 내가 바라는 대통령은 안보의식이 철저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야. 국민의 질타를 받는 것이 두려워 쉬쉬하며 정치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국민에게 알리고 만약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국민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정해경(국관 2) : 맞아. 어딜가나 소통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그렇다면 안보의식이 철저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이건 대북문제에 관한 건가?



김아리(국관 2) : 물론 대북에 있어서도 철저해야지. 군사적인 면이나 외교적인 면이나,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 대한 것이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선에서 외교를 맺어야지 그들에게 끌려가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정해경(국관 2) : 그래, 알겠어. 그럼 아람이 의견을 들어볼까?

박아람(국관 2) : 나는, 사실 우리가 바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나 역시도 소통의 문제가 중요하고 또 경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대통령이 잘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런데 사실 20 대는 물론이고 다른 세대가운데서도 '경제민주화' 자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뉴스나 신문에 가끔 대문짝만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모두 알다시피 요즘 신문 보는 사람이 줄고 있잖아.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문제들 역시 일반 국민에게 많이 그리고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해경(국관 2) : 맞아, 사실 우리도 정치에 관련된 과가 아니었다면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문제들이 참 많지. 마지막으로 수정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김수정(국관 1) : 저는 어느 곳에 가든 먼저 자기부터 당당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방국에 가서 위축되고 눌리는 모습이 아니라 어느 국가에 가는 한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또 자신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정해경(국관 2) : 그렇구나, 우리가 참 많은 면들을 이야기해본 것 같아. 교육, 복지,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소통문제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참 정신없을 것 같지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해서 대통령이 되기로 한 거니까 그 책임을 끝까지 지고 여기저기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한 학기동안 수고 많았고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모임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면 좋겠다.

선진화 과제 19:

생활문화의 선진화

(제 95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김다혜(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가정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확장 된다.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적인 생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비용 결혼문화는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을 유도하고 있고 그로 인한 높은 사회적비용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가정이 건강해야 그 사회가 건강합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생활문화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제 9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한국 사회의 고비용 결혼문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도, 가사 및 돌봄 노동에서 남성의 참여 증진,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부성의 역할 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명선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 원장은 평균 2 억에 달하는 높은 결혼식 비용, 맞벌이 증가로 인한 남녀 간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배, 한국의 장시간 근로문화와 회식문화로 인한 가족 간의 소통 시간 부족 등 문제점 개선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그릇된 음주문화와 회식 문화의 문제점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가사 및 돌봄 노동에서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 증진과 일 중심의 토론문화 부재를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근로시간을 지켜 남성들이 가장으로서 가정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도록 기업문화의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영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건강한 미래 공동체를 위한 언어문화의 세련된 품격을 갖출 것과 민족,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생활문화의 실현, 음식문화의 개선과 가정주부들을 위한 간편 메뉴 개발 등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병원 시스템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건의료영역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이나 자살률과 같은 일부 다른 성격의 지표들에 있어서는, 최하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한 사회의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징적 의미의 교환을 통해 구축되고 유지된다고 말하며, 문화적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역시 교환되는 상징적 의미를 선진화시키는 방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4 년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56.8%로 2008 년에 68.0%에 비해 9.2% 감소되었고 결혼을 선택사항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작은 결혼식 풍토 조성의 중요성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커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고비용 결혼문화와 생활문화의 문제점을 시사해 주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세대가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남녀가 정식 부부로 인정받는 것인데요. 소박한 작은 결혼식이 오히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자립정신을 키우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 한 연예인이 가족과 친지들과 조용히 작은 결혼식을 올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작은 결혼식 풍토를 조성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국립도서관 등 국공립 시설을 통한 양질의 결혼서비스 제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예비 교육의 중요성

대학교에서 예비 결혼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결혼과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교육은 결혼을 상품화하여 과장된 광고를 하는 사회에서 지혜롭고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관혼상제의 오랜 풍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고착된 생활방식을 지닌 부모님 세대들에게 작은 결혼식에 대한 공감을 형성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고비용 결혼식의 폐해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비용의 문제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을 알기 쉽게 교육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이 작은 결혼식과 지혜로운 소비의 모범적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SNS 와 TV 매체에서 널리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소비자로서 간소한 생활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길이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방안입니다.

② 김수빈(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3포 세대를 넘어 '5포 세대'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출처:YTN)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3 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요즈음의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3 포세대를 넘어, 5 포세대, 7 포세대라는 말까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대인관계와 내집마련, 심지어는 꿈까지 포기했다는 지극히도 비관적인 말인데요. 과거에 비해 분명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었는데, 언제부터 젊은이들의 미래는 이토록 어두워졌을까요.

소득의 증가와 관계없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도한 근로시간과 여가의 부족, 육아에 대한 부담은 삶의 질을 감소시키고 출산에 대한 기피를 낳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주제로 제 9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 제95차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주제발표자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결혼 및 가족문화의 문제점으로 고비용의 결혼문화,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노동, 장시간 근로문화를 지적하며 이러한 문화의 개선을 통해서만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이에 덧붙여 미디어를 통한 남성의 가사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더불어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음주문화 개선의 필요성 또한 제시했습니다.

이영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의식의 선진화를 강조하며 절약정신과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 등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자긍심을 가진다면 우리 문화를 더욱 알리고 역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상태, 성별 평등지수를 지적하였습니다. 가족문화의 개선과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건강 취약계층이 감소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개인, 집단, 사회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는 구성원들 간의 의미 교환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의미를 선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가정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거나 제 주위를 봐도, 제 또래 20 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이성문제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취업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겨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결혼식과 육아를 생각하면 더 이상 연애나 결혼은 즐거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생활문화의 선진화가 필수적이고, 생활문화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야근문화 등을 줄여 노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선 노동시간의 감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길지만 생산성은 상위 50% 수준입니다. 일하는 시간 대비 생산성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비효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야근, 회식문화를 줄이고 근로자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칼퇴'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업무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또한 확대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가사노동과 육아는 맞벌이 가정에서도 여성 담당입니다. 남성 직원들의 야근이 일상적인 회사에서 여성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도 눈치를 보며 겨우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탄력근무제의 시행이나 회사 내 보육시설의 확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허용 등 맞벌이 부부도

자신들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저출산 문제 또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큰 부분인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불안해지면 연애조차도 망설이는 청춘들이 늘어납니다.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가정의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생활의 차원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입니다.

③ 김승찬(동아대학교 경영학과)



IMF 구제금융 공식요청

정부 어제 발표…美·日지원금 포함 최소 200억弗 규모

대통령 오늘 특별담화…내주 조건 협상

국채발행등 지원액수 최소화 조치 병행

관련기사 2·3·7·8·9·22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시작은 IMF 사건 이었다.

대한민국은 21 세기를 맞은 이후 큰 문제에 시달렸고 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그 문제는 저출산 문제다. 90 년대 이후 떨어지기 시작한 출산율은 IMF 를 기점으로 그 하락세가 두드러 졌고 21 세기가 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저출산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세 가지다.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다른 하나는 구시대적인 가정문화의 잔재, 또 다른 하나는 가정생활을 좋아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기업문화다. 자식을 키우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IMF 이후 대중들의 경제력이 급감해 버린다.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려면 남편과 아내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사를 꺼려하는 남성들의 존재와 가정내부의 일을 더 어렵게 하는 시부모의 존재 그리고 파경을 부르는 지나친 혼수문화로 결혼을 꺼리게 만든다.

최근들어 강도가 약해졌다곤 하지만 가정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기업들로 인해 가사를 돌보려고 해도 돌볼 수 없게 만들고 이게 원인이 되어 가정분란까지 유도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들의 경우 출산을 하면 경력단절여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상황에서 누가 결혼을 하겠는가?



해결책은 존재 할 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3 개의 문제를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제 95 차 월례토론회를 주최하여 3 개의 문제중 하나인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가정생활 문화의 선진화는 고비용으로 시작하고 유지하지 않아도 가능한 결혼과 남녀가 공히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족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작은 결혼식 풍토 조성,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있어 남성의 참여 증진,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통한 부성역할 확립 및 아버지 행복 도모를 주장했다.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작은 결혼식이 확산되어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의식의 변화,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국민 소득 4 만 달러, 5 만 달러 시대로 진입한다고 말하였다.

이영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언행이 그 사회 생활문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늠자라고 말하며, 우리는 시설 등 하드웨어 면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서는 보다 많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014 년 OECD Health Data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은 병원시스템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건의료영역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이나 자살률과 같은 일부 다른 성격의 지표들에 있어서는, 반대로 최하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지적했다.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미디어가 평등한 가사 및 돌봄노동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당위성을 계속 부여하여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록 주제가 '생활문화의 선진화'지만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보면 초반에 거론한 3 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새 시대에 맞는 가정문화, 가정을 배려하는 기업문화, 이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문제의 공략법이다. 하지만 최혜경 이화여대교수의 말처럼 이 일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생활문화의 선진화에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려면 먼저 국민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보다 더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문제점이 인식이 돼야 개선하려는 의지가 생긴다. 문제점을 인식하려면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국민들은 저절로 관심을 가진다. 단 문제를 아주 크게 제기해야 한다. 크게 제기해야 국민들이 심각성을 더 알게 된다.

이렇게 언론을 이용해 분위기를 형성한 후 정부와 언론은 실제 사례를 수집한다. 실제 사례를 수집한 후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하나는 수집한 사례(자극적인 소재를 골라)를 국민들에게 알려 그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다른 하나는 재계의 인사들을 불러 수집한 사례를 이용해 만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주들을 설득한다. 협조를 받기 위해 지속적인 협상도 해보고 인센티브도 제시해야 한다. 그래도 설득이 안되면 강경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밑 준비가 끝나면 바로 캠페인에 들어가 국민의식 개선작업에 들어가고 동시에 가정친화적인 환경을 위한 각종 정책과 법안들을 통과 시켜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완성시킨다. 여기서 중요한게 있다. 국민의식이 확실하게 개선될 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에 중단하면 모든게 허사가 된다.

내가 제안한 내용은 분명 과격한 내용이다. 그러나 과격한 내용을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간은 절대 대한민국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례토론회에서 들었던 가장 기억남는 발언은 '2300 년에 저출산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으려면 조선 태종과 같은 냉정함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가정친화적인 문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발을 각오해야 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점이 있다. 결국은 정면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일도 결국 정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④ 김지용(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여성들의 육아 및 돌봄 부담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대되면서 가정생활에서의 책임이 균등하게 나누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여성의 가사부담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선진화를 이루어야만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생활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제 9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의 주제발표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들로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영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가정 생활상을 노출시키고 가사를 돌보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정생활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생활문화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미디어를 통한 생활 문화 선진화 방안이 자칫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여 지고 있는 가정들은 상당히 상위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위층 가정 생활상의 노출은 자칫 시청자들에게 가정 문화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고 생활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보여 지는 남성의 가사노동들은 일회적이고 이벤트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남성들의 가사 노동은 당연히 여성과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의 가사 노동이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생활문화의 선진화 방안은 선진적인 생활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결국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가 촉구되어야 합니다.

바른 가정문화에 대한 교육을 학교 공교육은 물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나 가정의 변화는 부모들의 인식 변화와 가정교육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바른 부모됨을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가정생활에 대한 정식적인 교육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의 선진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교육으로부터 출발하는 가정생활에 대한 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갖추게 하고 선진화된 가정교육이 행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⑤ 김한준(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삶의 질 부분에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 병원 시설, 의료비지출 등 보건의료영역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건강수준 인식 및 자살률 등의 지표에서 OECD 최하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분담시간과 여성의 낮은 사회참여율, 그리고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1 인당 연 평균 근로시간은 삶의 만족도와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OECD 36 개국 중 최하위권을 밑돌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에 이번 제 94 차 월례토론회에서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생활문화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부부 당 2 억에 달하는 높은 결혼식 비용, 여성에 편중된 가사노동,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성역할의 부재를 근거로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결혼식 확산, 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증진 그리고 장시간 근로문화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이명선 원장의 제안에 덧붙여 작은 결혼식 확산을 위한 의식 변화, 사회 지도층의 참여 및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일 수 있도록 가사 분담에 대한 남성들의 가치관과 태도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영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사람들의 언행이 그 사회의 생활수준을 결정한다고 지적하며 환경, 건강을 고려한 생활문화 구현, 정신이 건강한 미래공동체를 위한 언어문화의 개선, 전통문화 및 역사에 대한 자긍심 높이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전병율 연세대 교수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영역서 OECD 평균을 상회하나,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 및 자살률 등 다른 성격의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함을 지적하며 실생활이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최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한 사회의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징적 의미와 교환을 통해 구축되고 유지된다고 언급하며 상징적 의미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인 이명선 원장의 '양성 평등한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는 미디어환경 조성' 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들도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꽃분이네'에서 옷감을 고르던 앙드레김이 앞으로 남녀의 영역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자 주인공 덕수의 고모가 "차라리 남자가 애를 벤다고 해라." 하며 비아냥거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아직도 남녀의 영역은 생활문화의 선진화에 큰 걸림돌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비율은 55.6%로 미국과 일본보다 10% 정도 뒤쳐졌고, 여성의 1 일 가사노동시간은 158 분으로 남성 평균 26 분의 6.6 배입니다.

이는 남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중심의 근로문화와 저조한 여성의 사회참여비율로 대한민국의 1 인당 근로시간은 2163 시간으로 OECD 2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가사 남성은 직장이라는 개념은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이끄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의 영역이란 개념은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유명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모 프로그램에서 배우 차승원이 직접 요리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차줌마' 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아버지 요리교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매체에서 보이는 이미지로는 '차줌마열풍' 을 생활문화의 선진화로 이끌어 가기엔 역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남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여성의 1 일 가사노동시간 158 분 중 식사준비가 88 분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중 일부를 할애해 CEO 를 포함한 사내 임직원들이 참여해 요리를 배운다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남녀 간의 가사분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성 1 인당 1 일 가사노동시간 158 분 중 식사 준비에 할애하는 시간은 88 분이나 됩니다.

인천재능대학교의 경우, CEO 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요리대학'을 개설해 인기를 끌었고, 가사분담에 대한 중요성의 일깨우면서 남성 중심의 장시간근로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내 요리동아리와 조리관련학과 학생들이 직접 기업체나 관공서를 찾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식품이나 생활용품 관련업체에 후원을 받고 정부의 지원이 받쳐준다면 대학생들 주도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차줌마' 는 더 이상 텔레비전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과 요리교실 운영비용을 지원해주고, 기업체에서 요리교실을 만든다면,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기업에 찾아가 직접 요리교실을 개설한다면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과 남성중심의 근로문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사진 1 - The Wall Street Journal '한국인들의 불행지수는 어느정도일까?'
사진 2 - 동아일보 '삼시세끼서 빛나는 차승원의 요리실력'

⑥ 박소정(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근 한국에는 슈퍼우먼, 슈퍼맨 신드롬이 유행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슈퍼우먼 증후군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가사와 양육까지 훌륭하게 해내는 여성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단어의 유행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많은 부담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한국에는 또 다른 신드롬, 슈퍼맨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빠 어디가'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를 돌보는 예능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요리를 하는 남자들을 멋있게 비추는 예능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슈퍼맨 신드롬과 슈퍼우먼 신드롬이 과연 생활문화의 선진화에 긍정적일까요? 안 그래도 3 포세대와 5 포세대 등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미생활 등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슈퍼맨 신드롬과 슈퍼우먼 신드롬은 청년층에게 더욱 막중한 책임의식과 그에 대한 부담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문화의 선진화는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95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생활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제95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한국 생활문화 선진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측면으로 가족문화, 특히 가사 및 돌봄 노동에서의 여성편중을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성역할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 증진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통한 부성역할 확립 및 아버지 행복 도모를 제시했습니다.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의식 변화의 노력을 통해 작은 결혼식이 확산되어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1 인당 국민 소득 5 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013 년 기준 55.6%로 선진국들(미국 67.2%, 일본 6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한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영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의 관혼상제가 허례허식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문화계가 나서서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있으며, 21 세기에 적합한 한국의 의례, 특히 혼례와 장례 양식을 논의해, 의례문화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014 년 OECD Health Data 자료 기준, 기대수명이나 각종 질환 사망률, 병원 장비 등 시설적인 측면이나 병원시스템과 관련된 전반적인 한국 보건의료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이나 자살률과 같은 지표에서는 최하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징적 의미교환이 한 사회의 생활문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므로 생활문화 선진화를 위해선 그런 상징적 의미 또한 선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사 및 돌봄노동에 있어서는 '양성평등 행동에 대한 당위성 부여를 통한 사회적 규범 제시와 그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이라는 이명선 원장의 제안에 적극 동의를 표했습니다.



각 계층이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결국 생활문화의 선진화는 각계각층에서 노력해야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이 가능해질 때, 3 포세대, 5 포세대로 이어지는 청년층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과도한 야근 문화와 회식 문화를 줄이려는 기업측과 근로자들의 의식, 그리고 행동 변화가 먼저 촉구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하고 싶던 여성이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산에 대한 의사를 접지 않도록, 출산 및 육아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며,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기업 내의 근로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특히, 한 번에 약 2 억 정도가 드는 고비용

결혼문화로 인해 청년층뿐 아니라, 그 부모들 역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 매체가 나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허례허식 문화를 바로잡고, 소박한 결혼문화를 드라마나 예능에서 멋있게 그리는 등의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핀란드가 아이를 낳은 여성들 모두에게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제품을 전부 박스에 담아서 산모에게 '베이비 박스'를 주거나 일정 정도의 금액을 주는 정책 등을 본받아, 우리 정부에서도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SNS 나 불매운동 등을 통해, 근로시간 엄수와 직장 내 복지 확충 등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고, 보다 행복한 삶과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진 생활 문화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선진 생활문화.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과 기업, 그리고 정부와 미디어 등 각계각층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러한 선진 생활 문화는 어느새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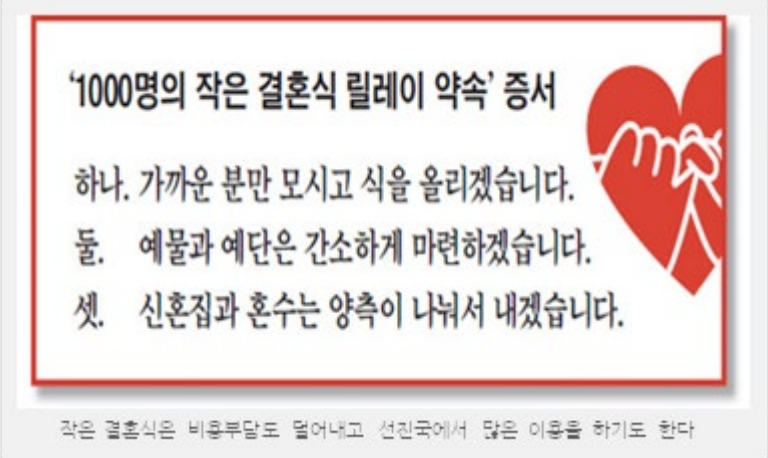
⑦ 박재형(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보통 사람들은 선진국을 동경하고 그들의 생활문화에 감명받고 본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에서 선진국들의 생활모습 문화모습 등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저런 생활문화를 가진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세계 15 위권 안에 속하는 강국이며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며 대체적으로 불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95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가정생활 문화의 선진화는 고비용으로 시작하고 유지하지 않아도 가능한 결혼과 남녀가 공히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족문화를 만드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은 비용부담도 덜어내고 선진국에서 많은 이용을 하기도 한다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작은 결혼식이 확산되어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의식의 변화,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영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공적인 공간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언행이 그 사회 생활문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늠자라고 말하며, 우리는 시설 등 하드웨어 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면에서는 보다 많이 의식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영역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이나 자살률과 같은 일부 다른 성격의 지표들에 있어서는, 반대로 최하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말하였습니다.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한 사회의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상징적 의미의 교환을 통해 구축되고 유지된다고 말하며, 생활문화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화적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역시 교환되는 상징적 의미를 선진화시키는 방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근본은 근로에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니다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로문화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에서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생활문화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에 따르면 멕시코에 이은 2 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최하위를 기록하며 상당히 비효율적인 노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정시퇴근이 어려운 야근문화, 지나친 회식문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고 정시에 퇴근한다하면 상급자가 눈치를 준다던지 안좋은 시선으로 보며 회사생활을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정시퇴근이 당연함에 불구하고 직장에서 상급자의 눈치를 보느라 퇴근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대다수입니다.



한국인의 회식자리에 술이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지나치게 잦은 회식과 도를 지나친 회식음주문화로 인해 대다수의 직장인이 자신만의 시간을 잘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문화로 인해 직장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지수가 떨어지며 생활문화의 선진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에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근로문화의 변화를 줄때가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업의 마인드가 바뀔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를 해야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OECD 의 표에도 나오듯 비효율적 생산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기업들에게 정시퇴근을 할 수 있게 홍보하고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체하여 기업인 교육을 통해 근로문화의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놔야하며, 변화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며 사내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 다른방법으로는 기업내에 직원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놀이방 등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걱정을 덜어주며 또한 정시퇴근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문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에서 음주를 제외한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방법들이 있으며, 자기계발을 해서 성과를 이루는 자에게 포상을 하여 직원들에게 자기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에 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서서히 근로문화를 변화시키려 노력한다면 근로문화는 점차 향상될 것이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생활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들도 한번에 선진화된 생활문화를 이룩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나라도 천천히 현재 생활문화들의 단점을 서서히 고쳐나가면서 법과 제도 등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동경하던 생활문화 수준을 이룩하게 될 것이고 경제력과 생활문화가 선진화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⑧ 박현진(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

5 포세대를 아십니까? 이는 연애, 출산, 결혼,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 이 다섯 가지를 포기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이 다섯 가지를 왜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주제로 제 95 차 월례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각 토론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이 현재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주었는데요.

먼저, 발제자인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높은 결혼식 비용 문제, 남녀 간 불평등한 가사 분담 문제, 장시간 근로 및 회식문화 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선 타임캡슐 연기소나무 결혼식

이에 대하여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작은 결혼식이 확산되어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의식의 변화,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다음으로 이영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면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영역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이나 자살률과 같은 일부 다른 성격의 지표들에 있어서는, 반대로 최하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양성 평등한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는데요.



OECD 최하위 출산율의 한국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어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출산 문제인데, 도대체 어쩌다가 대한민국은 이렇게도 낮은 출산율의 국가가 된 것일까요?

지난 몇 십년간 대한민국은 급격한 발전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그것보다도 더 가파르게 주거비용과 육아비용이 증가해왔습니다. 또한, 결혼식비용, 교육비용 등도 어마어마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되는 사회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은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누구나가 갖고 있는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는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육아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일반적인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공동주택단지 조성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들도 키워내는 것은 불가능하기만 한 것일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바로 정부 차원의 신혼부부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20 대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는 바로 어마어마한 주거비용 때문이고,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공동주택단지 조성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비용을 최소화해주는 효과적인 결혼 장려 정책입니다.

이에 더불어, 공동주택단지마다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하는 등 육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면, 이는 나아가 출산 장려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과 출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 정책을 어떻게 현실화 할 수 있을까요? 이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자체장 선거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혼부부 공동주택단지가 활성화 된다면, 이는 각 지역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양질의 주거단지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나아가, 각각의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려는 긍정적인 풍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신혼부부 공동주택단지 조성 활성화는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향후 결혼을 하게 될 우리들도 저비용의 결혼식 문화를 받아들이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간다면, 이는 국가적인 노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어두워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한 번 환하게 밝혀줄 수 있을 것입니다.

⑨ 백송희(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고비용의 결혼식 같은 허례허식이 사회에 만연해있다.

여러분 '3 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 한다는 뜻의 신조어였죠. 하지만 이제 3 포 세대를 넘어 '5 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내집마련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는 세대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여기에 가장 큰 이유로는 고비용으로 시작해야 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결혼 문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사회적 비용 증가는 여성들의 저출산 극복에 크게 장애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양성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 및 가사 부담은 점점 사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았습니다.



95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생활문화의 선진화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가정생활 문화의 선진화는 저비용으로 유지 가능한 결혼과 남녀가 공히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족문화를 만드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작은 결혼식이 확산되어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의식의 변화,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경제활동을 높일 수 있도록 가사 분담에 대한 남성들의 가치관과 태도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영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공적인 공간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언행이 그 사회 생활문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늠자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면에서는 보다 많이 의식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014 년 OECD Health Data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기대수명이 등의 병원시스템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건의료영역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이나 자살률과 같은 일부 다른 성격의 지표들에 있어서는, 최하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지적했습니다.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가사 및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양성평등한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이라는 이명선 원장의 방안에 적극 동의하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와 가정에서 공통체의식 함양과 남녀노소가 서로 존중하고 상부상조 하는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노력을 통한 건강한 시민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작은 결혼식 같은 건전한 풍토가 자리잡아야 한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사회에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우선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결혼식 문화가 한국에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하고 남성과 여성의 가사분담률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근무하는 풍토를 근절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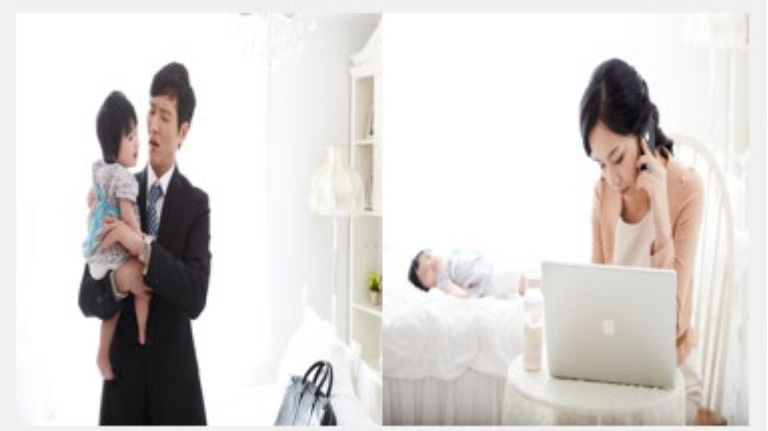
작은 결혼식 문화가 한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급력이 큰 미디어를 통해 작은 결혼식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일인지 보여준다면 사회 전반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결혼식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젊은 청년들에게 sns 및 미디어 매체가 주는 파급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적절히 녹인다면 사회 전반에 자리하고 있는 허례허식이 만연한 사회 풍토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족문화 측면에서 가사분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성역할의 부재를 살펴보아 기업에게 이를 교육하게 하고, 기업은 이에 책임을 느껴 장시간 근무 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현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행복한 가정, 더 나아가 행복한 사회, 선진화 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⑩ 송민상(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슈퍼맨·슈퍼우먼 신드롬 속에서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슈퍼우먼 증후군(신드롬)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슈퍼우먼 증후군이란 사회적으로 엘리트로서 인정받으며 성공한 워킹맘이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가사, 양육 등의 어머니의 역할도 동시에 훌륭히 성공해내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성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일하는 아빠들의 주말 육아 예능이 돌풍하며, 남성들에게도 일과 가정 모두에서 슈퍼맨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개인의 현실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적 특성상 부부가 모두 슈퍼맨, 슈퍼우먼 증후군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되는데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부부사이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공동의 숙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 양육이라는 불가피한 경력단절의 시간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주제로 제 9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가정생활 문화의 선진화를 고비용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가능한 결혼 풍토를 바탕으로 남녀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양립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감하며 여성이 경제활동을 높일 수 있도록 가사 분담에 대한 남성들의 가치관과 태도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1 인당 국민 소득 4 만 달러, 5 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가 어렵고, 또한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13 년 55.6%로 선진국인 미국의 67.2%, 일본의 65%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기혼 여성이 90%이상 직장에 다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이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현실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하고, 여성의 출산과 양육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력단절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기혼 여성의 90%이상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75%이상을 여성으로 대거 고용하여 여성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 안정적인 복지 보호망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민간 기업에게는 여성의 출산 및 양육 등의 경력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 혹은 복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공공 부문에서 여성을 대거 고용함으로써 여성들이 법적 보호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공공부문의 여성 채용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자.

앞서 언급했듯 남성과 여성이 슈퍼맨과 슈퍼우먼은 아니듯 민간기업 역시 고용확대와 복지확대라는 이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에 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안정적인 가정 구축 및 이를 통한 경제 성장 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 변화 및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 공공부문 고용 및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세수 문제,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예상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인 대합의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섣부른 정책적 결정으로 논쟁이 지속된다면 사회의 안전망이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 문화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미래의 국력과 성장에너지가 달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성과 여성 모두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에서 조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공공부문의 여성 고용 확대를 통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녀 전문가가 동일하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의 공공 부문 고용 확대에 따른 비용과 실익을 산출하고 국민들을 장기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TV 토론회,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후세와 우리 모두를 위한 인식의 대전환의 길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⑪ 송소담(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최근 남성의 가사 참여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삼시세끼’나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남성의 가사 참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에 방영되어온 프로그램들이 일터에서의 남성의 모습을 담아냈다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은 가정에서의 남성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남성의 가사분담으로 여성이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저비용 결혼 분위기를 형성하여 남성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건전한 가족문화의 회복운동’은 신뢰받고 품격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와 가정에서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남녀노소가 서로 존중하고, 상부상조하는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한발 한발 펼쳐 나가야 할 건강한 시민운동인데요.



제95차 월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지난 21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생활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제 9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은 가정생활 문화의 선진화는 고비용으로 시작하고 유지하지 않아도 가능한 결혼과 남녀가 공히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족문화를 만드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영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가 시설 등의 하드웨어 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사람들의 의식과 환경에 대한 행동 면에서는 보다 많이 의식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정 생활문화의 취약 계층 곧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한편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양성 평등한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명선 원장의 방안에 적극 동의하였고, 마지막으로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작은 결혼식의 확산을 위해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이 경제활동을 높일 수 있도록 가사 분담에 대한 남성들의 가치관과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표 3>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돌봄노동 시간 비교

(단위: 분)

	항목	남성	여성
가사노동	식사준비	6	88
	청소	7	30
	세탁	1	21
	물품구입	4	14
	집 관리 등	6	5
	합계	**24**	**158**
돌봄노동	미취학 자녀 보살피기	7	21
	초중고 자녀 보살피기	3	16
	배우자 보살피기	1	3
	그 외 가족 보살피기	2	2
	합계	**13**	**42**

자료: 통계청(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 및 돌봄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13 년 현재 55.6%로 선진국인 미국의 67.2%, 일본의 65%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우선 막중한 가사 및 돌봄 노동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은 약 7 배, 돌봄노동은 약 3 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회피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한편 결혼 비용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막대한 양의 비용을 부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약 1 억 원으로 무시하지 못할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남성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미디어를 통한 의식개선', '회사 내 놀이방 개설', '연예인들의 간소화 결혼식 확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근본적인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남성의 가사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해줌으로써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돌봄노동에 대한 시간을 줄여주기 위하여 회사 내 놀이방을 개설하여 여성이 마음 놓고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세계적인 회사인 구글이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회사 내 놀이방을 개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결혼식을 간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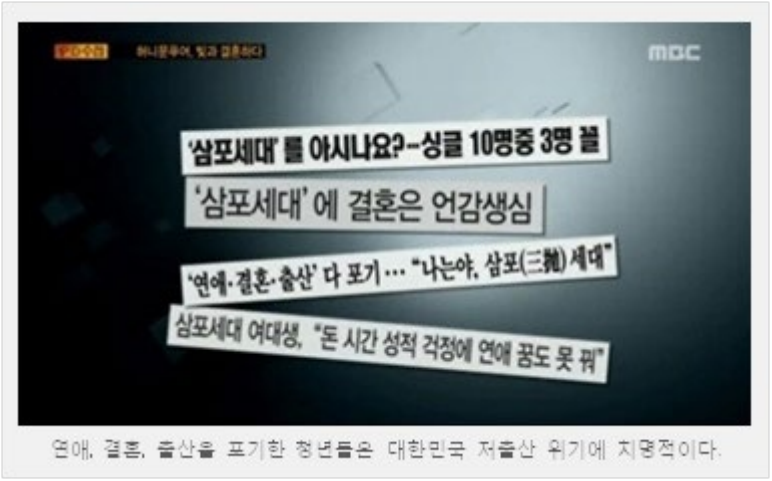
그리고 남성의 결혼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 결혼식 간소화를 적극 확대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효리나 김나영 등 유명 연예인이 자신들의 결혼식을 매우 간소하게 치르면서 결혼식 간소화 문화가 어느 정도 확대되었는데요. 연예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지속해서 알려나간다면 남성의 결혼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남성도 가사 노동 및 돌봄 노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결혼식은 무조건 화려해야 한다는 인식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사회와 가정에서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남녀노소가 서로 존중하고, 상부상조하는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발 한발 펼쳐 나가야 할 건강한 시민운동, '결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그림 1 스타서울
그림 2 스포츠뉴스

⑫ 윤수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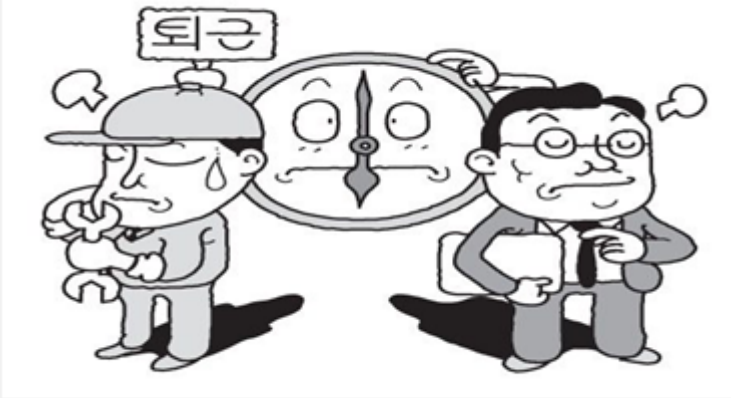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은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에 치명적이다.

최근 청년 계층을 가리켜 '3 포세대', '5 포세대'라고 부릅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취업난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다는 뜻인데요. 무엇보다 고비용 결혼 문화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육아 부담 등의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심각한 저 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는 부분에서 결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4 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여성 1 인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5 로 조사 대상국 224 개국 중 219 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95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생활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해 보았습니다.



올바른 선진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장시간 근로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한국 생활문화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측면으로 가족문화, 특히 가사 및 돌봄 노동에서의 여성편중을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성역할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 증진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통한 부성역할 확립 및 아버지 행복 도모를 제시했습니다.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의식 변화의 노력을 통해 작은 결혼식이 확산되어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1 인당 국민 소득 5 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013 년 기준 55.6%로 선진국들(미국 67.2%, 일본 6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한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영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이 시설 등 하드웨어 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길거리, 엘리베이터, 버스나 지하철, 식당, 목욕탕, 강의실, 복도, 갤러리, 박물관 등 사회 생활문화 수준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공적인 공간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순화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014 년 OECD Health Data 자료 기준, 기대수명이나 각종 질환 사망률, 병원 장비 등 시설적인 측면이나 병원시스템과 관련된 전반적인 한국 보건의료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이나 자살률과 같은 지표에서는 최하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징적 의미교환이 한 사회의 생활문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므로 생활문화 선진화를 위해선 그런 상징적 의미 또한 선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사 및 돌봄노동에 있어서는 '양성평등 행동에 대한 당위성 부여를 통한 사회적 규범 제시와 그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이라는 이명선 원장의 제안에 적극 동의를 표했습니다.



선진 가정문화의 키워드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과 균형이다.

결국 생활문화 선진화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바로 가정생활의 선진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이 가능해져야만 여성들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기피를 줄이고 남성들 또한 가정 내에서 가장으로써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야근 문화를 철폐하고, 기업 내 근로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두가 동등하게 가정 내에서 행복할 수 있는 동시에 가사 분담 또한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과 기업 문화 개선 유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해지는 가장 큰 연유 중 하나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남성과의 차별이 난무하는 직장 내 '유리천장의 존재'인 만큼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소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의 보완과 여성 인재 채용 활성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장 어둡게 만들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대다수 청년들이 고비용 결혼문화로 인해 결혼은 물론 연애까지 기피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거품 없는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올바른 생활결혼문화 인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해 사회 전반의 잘못된 결혼문화 풍조를 바로잡고, 올바른 혼수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셀프 웨딩', 즉 웨딩 사진, 결혼식 드레스 마련, 결혼식장 준비 등을 최대한 거품없이 저비용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바람직한 현상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선진 생활문화로 나아가기 위해 허례허식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어야 한다.

선진 생활문화란 겉모습만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문화 내 균형을 바로잡고, 특히 그 가정문화의 시작을 구성하는 중요한 관문인 결혼문화의 허례허식을 걷어내야만 우리 나라 또한 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생활 문화의 기초를 쌓아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⑬ 이윤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이 맞닥뜨린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여성 1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14 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1.25 로 조사 대상국이었던 224 개국 중 219 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이나 양육비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업 문화의 선진화를 통하여 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95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작은 결혼식이 확산되어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의식의 변화,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으며 여성이 경제활동을 높일 수 있도록 가사 분담에 대한 남성들의 가치관과 태도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영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길거리, 엘리베이터, 버스나 지하철, 식당, 목욕탕, 강의실, 복도, 갤러리, 박물관, 야외공원 등 공적인 공간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언행이 그 사회 생활문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늠자라고 말하며, 선진국 대열에 끼기 위해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면에서 보다 많이 의식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기대수명이나 병원시스템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건의료영역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이나 자살률과 같은 일부 다른 성격의 지표들에 있어서는, 반대로 최하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생활문화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화적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역시 교환되는 상징적 의미를 선진화시키는 방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하며 특히 가사 및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양성평등한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이라는 이명선 원장의 방안에 적극 동의하였습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결혼 측면에서 고비용 결혼문화를 진단하고, 가족문화 측면에서 가사분담의 여성편중, 그리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성역할의 부재를 살펴봄으로써 생활문화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정 문화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근로환경과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음주 위주의 과도한 회식문화 개선 등 기업문화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어려움은 규정된 업무시간 외에도 일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퇴근 후에도 업무의 연장선이 이어지고 있으며 과도한 회식문화 역시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문화는 여성들에게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퇴근 후의 자유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회식문화는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참석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음주 위주의 회식문화에서 탈피해서 연극이나 스포츠를 함께 즐기는 등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야근을 자제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밤에 하는 회식 대신 낮에 회식을 하여 퇴근 시간 이후에는 자유시간을 보내거나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일부 기업들은 업무가 끝난 저녁시간에는 직원들이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회식을 낮에 진행하면서 팀워크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법을 실행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회식비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문화 자체가 그 기업의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또한 유도해야 합니다.



유연 근무제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가 개인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남녀가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면 양육하는 데에도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근을 자제하고 회식문화를 바꾸며,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의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은 단순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 애사심을 높이고 적절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또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대학생들이 가정친화적 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국내외 사례를 발굴하여 sns 에서 서로 공유하고 취업준비카페 등을 통해 이야기를 나눈다면 기업문화의 선진화를 촉구하는데 작지만 강력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문화를 선진화시키는 일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 더 높은 성장을 위하여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조금씩 바뀌려는 노력을 해나가야만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림참조 1 : https://www.youtube.com/watch?v=bAw_e-3ETRA

⑭ 이정진(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5월 21일 생활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95차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57 쇼크'란 1989 년 일본의 출산율이 1.57 명으로 떨어지자 일본 정부가 이를 1.57 쇼크라 부르며 각종 출산율 제고 정책을 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일본은 2015 년 현재 1.4 가 넘는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1970 년대 출산율이 2.47 로 떨어지자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여기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는 고령화가 시작된 선진국 가운데에 출산율이 2.0 을 넘는 몇 안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 명으로 전 세계 224 개국 가운데 220 위라는 세계 최하위권에 속해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 교수는 이를 방치한다면 한국은 저출산에 의해 '인구 소멸국가 1 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저조한 출산율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낮아지는 혼인율입니다. 실제로 출산율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인 유배우율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비율)이 가임기 여성의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2013 년 기준으로 25~29 세 여성의 유배우율은 25%에 불가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해소와 올바른 공동체 형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지난 5 월 21 일 한국선진화포럼은 '생활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 하에 제 95 차 월례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고비용의 결혼문화와 가사분담의 여성 편중, 장기간 근로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부성 역할 부재가 낮은 결혼율과 저출산율을 야기하는 요인이므로, 작은 결혼식 문화를 정착시키고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병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역시 작은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해야 하므로 가사 분담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낮아지는 출산율과 결혼율,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 남녀 직장인들의 결혼관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79.8%는 결혼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반면 여성의 63.2%는 결혼이 직장생활의 걸림돌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직장인들이 결혼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육아에 대한 부담, 가사에 대한 부담, 직장 내에 부족한 기혼자에 대한 배려 등이 꼽혔으며, 결혼으로 인한 퇴사 압박, 승진 시 차별, 임금 차별 등을 겪은 여성 직장인이 36.5%였습니다.



가사일과 육아를 함께 한다는 올바른 성 역할이 자리 잡혀야 한다.

결과적으로 육아, 가사 활동에 대한 직장의 배려와 배우자의 가사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혼 남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미혼 남성 70%는 결혼 후 맞벌이를 원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맞벌이를 할 경우 가사 분담을 하겠다는 남성은 9.8%에 그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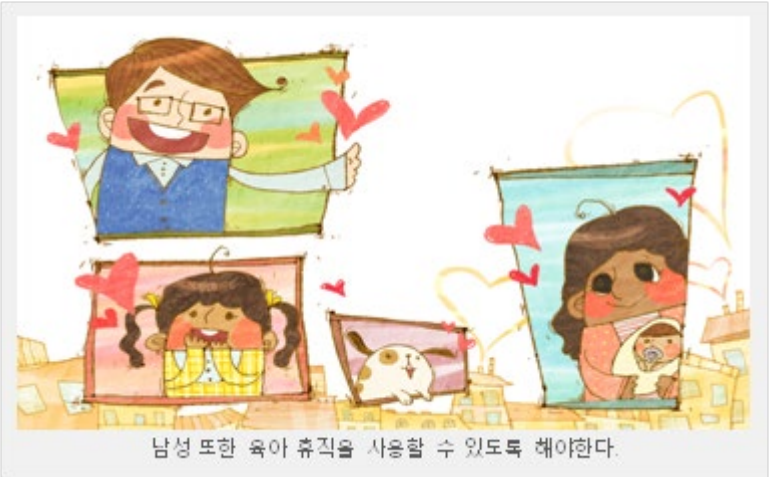
남편과 아내 모두가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으면 가사일을 돕는다거나 혹은 가사는 아내의 몫이라는 의견이 약 40%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남성의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 부재와 여성의 결혼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알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성관념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의 가사일을 도와준다'라는 식의 일방적인 성적 고정관념을 주입시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함께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로써 가사일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분담하는'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도록 만듭니다. 일례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인으로서 남자가 2 차 성매매 업소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주위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우위화와 여성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말이며, 남성에 대한 불신과 함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의 경우 이를 하나의 사회 통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매매를 하나의 사회적 관습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성적 인식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올바른 성적 관념이 인식되도록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웹툰이나 만화, 드라마의 그릇된 대사가 그릇된 성관념을 내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꾸준한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스웨덴의 출산 정책이 이끈 놀라운 변화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육과 육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대하여 책임감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정책의 핵심은 여성과 남성이 육아 휴직을 공동으로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육아 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였으며 가정에 대한 남성의 책임감과 역할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는 스웨덴 출산율을 사상 최저 1.5 명에서 현재 1.9 명으로 높였으며 양성평등을 실현함으로써 고용과 출산을 높이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남성의 육아 휴직을 권장해야 하며, 출산에 따른 육아 수당을 소득과 가족 구성원 비율 등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회사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각 회사마다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는 보육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비중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육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 수 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율을 재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이상 출산이 직장 생활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각 대학 내에 가상 결혼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양 수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사회, 남성, 여성의 역할을 나눈 뒤 자신의 이익과 사회 관념에 맞추어 역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업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고 고쳐져야 할 관습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리 결혼 생활을 체험해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결혼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장시간 노동. 모든 요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생활문화를 이루는 요인들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평등은 한국 사회의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히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⑮ 정우재(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한국사회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국가적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1 인당 부양해야 할 인구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1 인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 포 세대'와 여기에 '인간관계,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다는 '5 포 세대',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 같은 신조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생활 문화의 선진화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가족 구성원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생활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제 9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가족 체계의 문제점으로 결혼 측면에서 고비용 결혼문화를, 가족문화 측면에서는 가사분담의 여성편중과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성역할의 부재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작은 결혼식 풍토 조성, 가사 노동에서 남성의 참여 증진 그리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통한 부성역할 확립을 제시하였습니다.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1 인당 국민 소득 4 만 달러, 5 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가 어렵다며, 여성이 경제활동을 높일 수 있도록 가사 분담에 대한 남성들의 가치관과 태도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영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이 하드웨어 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등 소프트웨어 면에서는 지구환경보존, 국가공동체에 대한 관심, 국가정체성 함양을 통해 보다 많이 노력해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시스템적 측면은 우수하지만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이나 자살률과 같은 다른 성격의 지표들에 있어서 최하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지적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가족 체계를 통해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가족은 국가유지의 기본 단위로서, 그 자체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통해 인구를 유지하며, 경제활동을 통해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자립이 힘든 아동이나 노인들을 돌보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생활문화의 측면에서 국가에 우선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비용 결혼문화로 인해 가족 형성 자체가 부진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로 인해 출산율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맞벌이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에 있어서 여성에게 부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가족'이 국가유지의 단위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결혼문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아이의 양육에서부터 대학 졸업까지 교육비, 취업을 하고 나서 결혼비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30 년 가까이 부모가 그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두 명은 커녕 한 명도 낳지 않거나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벌이를 해야만 겨우 유지가 가능한 상황인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한국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캥거루족'같은 신조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 역시 불확실합니다. 평균 은퇴 나이가 52 세로서, 자녀의 독립은 부모의 은퇴 시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OECD 노인빈곤율에서 한국이 1 위를 차지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은퇴 이후의 삶은 본인 스스로를 돌보기도 힘든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자녀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합니다. 자연스레 부모 세대는 자신들의 노년을 돌볼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녀 세대는 자녀 세대대로,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자녀 세대는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립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 때는 부모에게 도움 받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한국 사회는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마보이'가 문제가 될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 사소한 선택까지도 부모의 허락 없이는 하지

않거나 결정을 하지 못해 대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정을 형성한다고 한들 그 가정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은 유지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뒷바라지로 인해 자신들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하는 외국의 경우, 부모들은 일을 해서 벌게 된 소득으로 은퇴 후 삶을 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0 살이 넘어서도 독립하지 않는 자식들을 돌보느라 노후를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심해여 그 부담 역시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족 체계 유지의 핵심은 자녀 세대의 자립심과 책임감을 기르는 것.

따라서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가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족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가족 체계의 비결은 바로 자녀 세대의 이른 독립에 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이른 독립을 가족 내 생활문화와 사회적 문화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책임감과 자립심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역할은 조언을 해주는 선에서 그치고 본인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성숙한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3 포 세대나 5 포 세대, 캥거루족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사회구조적 책임에서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개인의 도전 정신과 독립심 부족으로 인해 의존, 안주하는 문화에서 더 큰 원인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과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기존 가정문화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가정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근본적인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의 이른 독립을 통해 구 가정문화에서 탈피,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이 뒷받침되는 새로운 가정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⑯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부)



선진화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우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 간의 갈등, 저출산과 고령화 등등의 문제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심에만 관심을 두고 산적한 사회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들 중 저출산으로 인하여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은 삼포, 오포세대 등으로 불리며 취업, 결혼, 출산 등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은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초혼 남성의 평균나이는 1995 년 28.4 세였는데 2015 년에는 32.4 세로 증가하였습니다. 초혼 여성의 경우, 1995 년 25.3 세에서 19.8 세로 증가하였습니다.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저출산은 물론 노산의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 년 혼인율은 30 만 5500 여건으로 전년 대비 1 만 7300 여건 감소하여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혼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율 중에서도 황혼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는 소통으로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소통의 부족'이라는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래끼리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찾는 과정도 서투르고 회사 동료,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식 수업방식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초, 중, 고교 과정에서 도입이 어렵다면 대학교육에서라도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었으면 합니다.

토론을 통해서나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토론은 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토론을 통해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혼인율의 증가와 이혼율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교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토론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운영하는 각 대학별 '선진화 연구모임'입니다.

매월 진행되는 한국선진화포럼의 월례토론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각 대학별 아카데미생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점, 희망사항 및 건의사항을 통해 국가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활발해진다면 젊은 층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것이고 현재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회구조와 제도 변화 등을 통해 사회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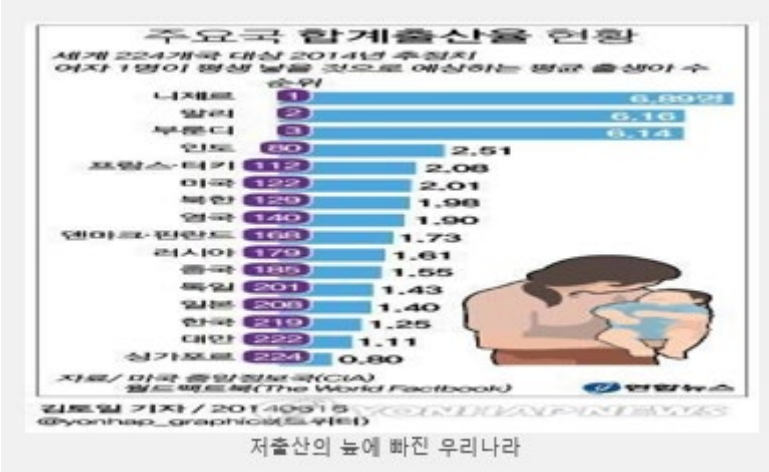


토론을 통해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난이 해소된다면 자연스럽게 혼인율이 증가하고 소비와 지출이 늘어 경제는 활력을 띠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과 시도만으로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커다란 태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진화 연구모임'이 소통을 위한 첫 통로가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선진화되길 바랍니다.

⑰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저출산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자 1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2 명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출산율이 2 명 가까이는 되어야 인구의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그 정도의 수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몇인지 아시나요? 2014 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5 명이며 세계 224 개국 중 219 위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낮아지면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국가 경제를 이끌고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의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보건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고령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 세 이상 노인인구는 2030 년에 1269 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4.3%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60 년에는 1762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까닭은 결혼을 늦게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녀양육이 힘들어서 자녀를 1 명만 낳거나 낳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많은 20 대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필요없는 대학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전국에는 400 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구수와 국토면적을 고려할 때 너무나도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이름만 대학이고 초중고생이 다니는 학원만도 못한 대학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현재 70%정도 되는데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40%인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높은 진학율입니다. 대학을 나오면 자신의 능력에 비해 눈높이만 높아져서 취업을 못하고 백수로 취업준비를 수년씩 하게 됩니다.

대학수를 줄여서 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곧장 취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실제로 대학졸업자가 필요한 직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학수를 줄임과 동시에 학문적역량이 필요없는 직업에는 회사들이 대학이 아니라 자격증을 중심으로 뽑도록 정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학등록금과 기타비용으로 연 1 천만 원을 낭비하고 4 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젊은이들이 20 대 초반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대학졸업장과 함께 만들어지던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능력과 자녀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따라서 출산율도 자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캥거루처럼 키워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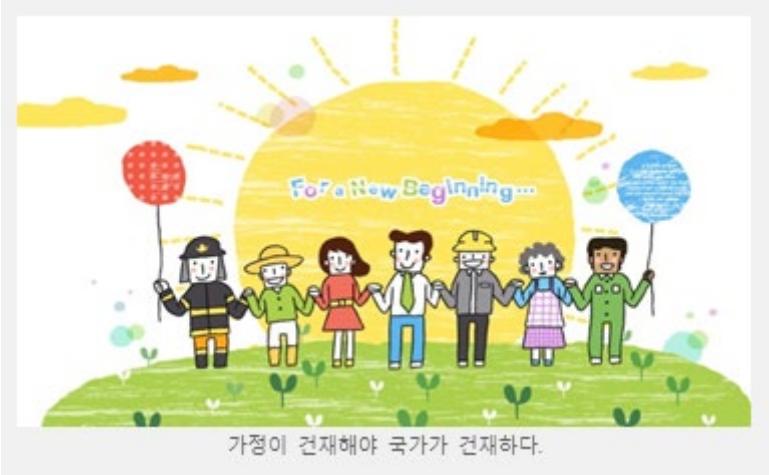
다음으로 20 대들이 스스로 벌어 스스로 입고 먹는 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20 대가 되어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자신은 돈을 벌지 않습니다. 이러한 20 대들은 돈이 벌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기 힘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20 대가 된 자녀들에게 쉬고 잘 수 있는 집 이상은 제공하지 말고 스스로 벌어 스스로 입고 먹는 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다보면 돈벌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돈에 대한 개념도 터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눈높이, 결혼에 대한 생각 등이 현실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배우자를 기다리던 20 대들이 현실적인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고 결혼비용이 낮아져서 결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결혼을 하고 전보다 낭비가 줄어들어서 출산율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비용 비효율적인 사회구조를 바꾸고 잘못된 개인의 의식을 고치는데 성공한다면 결혼연령이 낮아지고 결혼이 늘어나며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1 명이 노인 1 명을 부양하게 되는 암울하고 늙어버린 대한민국이 아닌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찬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선진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⑱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가정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식처이자 국가를 유지하는 단위입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적 덕목을 기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가정이 화목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이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글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족을 이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다름 아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한국의 고용시장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자리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후진적 위치에 있고, 가정의 기둥인 50 대 가장들은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을 당하게 되는 사회구조입니다.

5 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취업난과 팍팍한 삶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했다는 2030 세대의 자조 섞인 말로서, 따지고 보면 참 비참한 말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꿈, 희망을 추가한 7 포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화목은커녕 가정을 이루는 일조차 버거운 사회구조에서 우리는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저는 우선 고비용 결혼문화를 바꾸는 일부터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문제와 더불어 우리사회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결혼문화입니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1)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2011 년 평균 결혼 비용은 2 억 800 만 원을 상회하며, 이는 중소제조업 평균 임금 기준 7.6 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신혼주택과 혼수 마련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합니다.

같은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관혼상제 중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혼례 문화를 지적했는데, 남녀 모두 과도한 비용을 주요 문제라고 인식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지난 5 월에는 대한민국의 톱스타 배우인 원빈과 이나영이 강원도 정선의 계곡 인근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30 여명의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했고,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는 단 한명도 초청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예인의 결혼식이라면 으레 특급호텔의 호화 결혼식을 떠올리게 되지만, 최근 들어 자유롭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올리는 연예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들판 결혼식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꿈꿔온 결혼식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이 멋지게 느껴집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부부의 행복을 빌어줄 가족들을 모셔놓고 백년가약을 맺은 것도 뜻 깊습니다. 꼭 외부에서 식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결혼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호화로운 결혼식이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소박하고 개성 있는 기억을 만드는 것이 보다 의미 있지 않을까요?

사실 고비용 결혼 문화는 결혼식이 자식 행사가 아니라 부모님 행사이고, 남들에게 지출했던 축의금을 다시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혼의 주도권이 본인에게 있는지 부모님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새로운 결혼 문화가 정착될 것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그래도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사회구조에서, 무리하여 고비용 결혼을 고수하기보다, 신혼여행을 즐겁게 다녀오고, 집을 위해 '빚 져야하는' 부담도 약간이나마 덜게 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문화의 선진화일 것입니다.

⑲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대한민국, 선진국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위상은 어떠할까요?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발전으로 GDP 세계 14 위의 경제대국이자 교역 1 조 달러의 세계 8 위 무역대국, 세계시장에서 휴대폰 및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초일류기업의 발전 등 다방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의 생활문화는 그만큼 성장하였을까요? 결국 편하게 살기 위해 경제발전을 향해왔지만 그 꿈과 현실의 괴리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생활수준은 그에 맞게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히 직장인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근로시간, 자유롭지 못한 퇴근 등에 기인합니다. OECD 주요국의 연 평균 근로시간에서 대한민국은 연 2163 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70 시간을 훨씬 웃도는 시간을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 평균 5 회 이상 정시퇴근 하는 근로자는 4 명 중에 한 명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터로 내몰린 한국 직장인

퇴근을 제때에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끼리 집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 힘듭니다. 퇴근한 직장인들이 일에 지쳐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홀로 조용히 지내는 경우도 많으며 여성들의 경우는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느라 분주한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이렇듯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직장인들이 가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직장인들 사이에 만연한 인식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으로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근로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기업이 주체가 되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업은 여러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하는 '시간'이 아닌 일의 '양'으로 근로성적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채워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완수하여 퇴근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면 노동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다른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그칩니다. 외국에서 모든지 열심히 한다고 평가받는 한국인이 그렇게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이유에는 제도적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과를 바탕으로 일찍 끝낸 직장인들은 그만큼 일찍 퇴근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은 어느 성과 이상을 내면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직장인들을 매달 홍보하고 표창하는 행사를 열어 직원들에게 가정에 대한 애정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가정이 행복해야 기업이 잘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기업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화목한 가정 속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그만큼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고 근무태도도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직장인들에게 가정에 신경쓰도록 장려할 유인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잘 이행하는 직장인들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표창해준다면 효과가 매우 커질 것입니다. 수상자들을 예를 들어 '슈퍼맨'라고 표현함으로써 일과 가정 한쪽을 포기하지 않고 모두를 책임지는 직장인임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에 모두 성공한 슈퍼맨을 홍보하자!

게다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이런 시상식을 연다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일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일과 가정의 적절한 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 직장인들이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이 주체가 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생활문화의 선진화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기에는 '기업'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업무 환경 개선 등 기업의 노력과 개인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루어낼 수 있는 과제입니다.

생활문화의 선진화는 어쩌면 경제의 선진화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함께 도와준다면 그 시기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일과 가정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기업이 배려해주길 기대합니다.

⑳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오늘날 젊은이들의 걱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삼(三)포세대'

최근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최고 톱배우인 원빈과 이나영의 결혼식이었는데요. 원빈의 고향인 강원도 정선의 한 밀밭 오솔길에서 작은 식을 열어 형식보다 의미에 더 무게를 둔 소박하고 작은 예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삼(三)포세대라고 부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삶의 3 가지 과정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수부터 시작해 신혼집, 예식장까지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낳는 것 역시 산후조리원부터 아이교육까지 생각해야 하는 현실에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이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1.21 명에서 더욱 밑돌 수도 있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노령인구에 대해서 복지와 연금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데요. 삼포세대의 끈을 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연한 결합으로 낳은 아이들 역시 법적보호를 받는다면?

저는 제일 먼저 '결혼'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며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결혼'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기까지 예물이며 혼수, 예식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렇다면 이러한 '결혼'이라는 틀을 깨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법률혼과 함께 사는 동거 형태의 사실혼의 경계를 없애고 사실혼 역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젊은 남녀에게 결혼은 한결 쉬운 형태의 결합으로 보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154 년이 걸린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로 출산율 안정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까지 26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프랑스가 이러한 문화에 앞장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동거'를 장려하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동거하는 남녀의 결합 역시도 법률혼과 같은 동등한 위치로 인정해 주며, 그들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모의 자녀와 동등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커플들에게는 일정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정교육 후에는 간단한 인증 단계를 거쳐서 출산까지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의료적 혜택과 경제적 혜택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법률혼의 부모들도 잘 쓰지 않는 출산휴가를 이들 사실혼 커플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 남녀의 동거를 쉬쉬하는 분위기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현대의

인식으로 이끄는 국가의 인식 바꾸기 노력도 필요합니다.



엄마들의 경력단절 걱정과 보육걱정을 덜어주는 '학교'를 활용하자

우리나라 예비 엄마들의 고민은 단순히 출산휴가 사용유무에 그치지 않는데요. 더 나아가 육아 동안에 엄마의 경력단절에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미루는 예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고민인 유리천장 현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보육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경우 오전 8 시 40 분~9 시에 등교해 낮 12 시 30 분~1 시 30 분쯤 하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마들이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간에 아이들이 하교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엄마들의 걱정은 늘고, 학원에 대한 의존은 느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오전 8 시~8 시 30 분에 등교해 오후 3~4 시쯤 학교를 마친다고 합니다. 엄마의 노동시간과 비슷하게 끝나도록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엄마들의 걱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렇게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



삼(三)포세대 해결은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출산율 장려보다는 이민자 정책을 사용하여 자국민 수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도 국가의 경쟁력인 인구수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단순히 수 늘리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포세대,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현재의 2030 세대를 지나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사회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후에 22 세기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도 정직한 길일 것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3포세대, 5포세대 등 젊은 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박소정(서울대 사회복지 3):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 내에서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 '3 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이에 더해 5 포, 7 포세대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20 대가 생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2030 세대인 저희의 입장에서 젊은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또한 20 대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과 출산 등의 문제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대학생 때까지 키우는 데 평균적으로 2 억의 비용이 든다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의 지원은 아직 아이를 낳으면 일률적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하나하나 신경쓸 것이 많은데 돌봄서비스 또한 아직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산이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빈(언론정보 2): 노동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노동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업문화는 아직 야근을 강요하고, 6 시에 칼퇴근을 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될 만큼 노동 강도가 강합니다.

잦은 회식과 건전하지 못한 음주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업무능력이 아닌 이러한 요소를 통해

평가받고,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남성의 가정참여는 더욱 줄어듭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효율을 높일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박지훈(중어중문 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여성을 일찍 퇴근시키는 등의 해결책으로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닌,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긴 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벌겠다는 차원이 아닌, 승진 등 회사 내에서의 입지와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애, 결혼이 감소하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단정 짓고 '3 포'라는 말을 대입하는 것도 젊은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육아를 부부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김수빈(언론정보 2): 근로시간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씀하셨듯이 육아를 남녀 모두가 부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박소정(사회복지 3):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을 직장에서 기피하거나,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처럼 아이를 많이 가지는 여성을 비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등을 통해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 논의로 넘어가 보자면, 2030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원인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로 인해 '작은 결혼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결혼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지훈(중어중문 5): 허례허식을 줄이고 작은 결혼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 결혼 상대방 모두와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데 축의금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듯합니다. '축의금을 낸 만큼 돌려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만큼, 당장은 어렵겠지만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빈(언론정보 2):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도 우리 세대에게 큰 경제적 부담입니다. 최근 SNS 에서 우스개로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젊은이들의 데이트 비용이 월 평균 23 만 8 천 원이라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시장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데이트 문화가 변화하면서 데이트 비용도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카페, 영화관, 심지어 공원에 가도 기본적으로 다 비용이 소모됩니다. 큰 경제적 수입이 없는 20 대에게는 이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박소정(사회복지 3):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랑 놀거나 데이트를 하려 해도 막상 갈 곳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미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도 부족해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중어중문 5): 우리나라와 가장 상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이미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3 포세대에 이어 히키코모리 문제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회가 변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미디어를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김수빈(언론정보 2):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삼시세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남성의 육아나 가사노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요리하는 남자'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프로그램을 보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졌다는 또래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등을 사용해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박소정(사회복지 3):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신중한 사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TV 속에서 남성의 가사에 대해 서투른 모습만을 보여준다든지, 일주일의 하루만 아빠가 엄마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행동은 자칫 육아를 '이벤트화' 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노동 등을 일상적으로 그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3 포세대 등 각종 사회적 부담을 안고 있는 2030 세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우선 과도한 노동시간의 압박과 결혼 비용의 부담 등으로 3 포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근로 환경의 개선이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확대와 인식 개선을 통해 남녀 모두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도한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작은 결혼식 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20 대가 연애비용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끼는 만큼 문화공간이 더욱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통해 결혼과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게는 위와 같은 가정의 우선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소정(서울대 사회복지 3):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3 포 세대'와 '5 포세대', 더 나아가 요즘은 7 포세대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젊은 층의 생활 상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어떻게 하면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 20 대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과 출산 등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이나 육아복지제도 등이 시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 질적, 양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아직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대기번호로 들어가는 등 보육시설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핵가족화로 인해 아이를 쉽게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질 높은 보육제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도 그다지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 문화의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수빈(언론정보 2): 노동환경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기업문화는 6 시에 퇴근하는 사람을 회사에 충성심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생각할 만큼, 회사에 대한 희생과 양보가 강요되어져 왔고, 노동강도 역시 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가정에 대한 참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잦은 회식과 건전하지 못한 음주문화도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여자를 4 시에 우선적으로 퇴근시키는 등의 정책을 통해 가정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역시 노동시간과 강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지훈(중어중문 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여성을 일찍 퇴근시키는 등의 해결책으로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 모두에게 동시에 이루어져야하지, 한 쪽에게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오히려 가정의 일은 '여성'이 주이고, 남성은 돕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대시켜, 결국 여성에게 더 큰 짐을 지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사는 여성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오래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벌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승진 등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와도 관련되는 문제이기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제 평생직장의 시대도 아닌데,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 완전히 충성을 바쳐야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사회에 만연한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연애와 결혼이 감소하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단정 짓고, 개인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바라보는 것 역시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수빈(언론정보 2): 육아를 남녀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남성에게도 육아 휴직이 충분히 제공되어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사회복지 3):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처럼,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여성에게 눈치를 주거나, 아이를 많이 가지는 여성을 비난하는 일 역시 없어져야 합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공익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를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결혼과 연애에 있어, 경제적 문제도 큰 원인입니다.

아까 박지훈씨가 언급하셨듯, 2030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며, 허례허식이 없는 '작은 결혼식'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결혼식을 꿈꾸고 있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작은 결혼식이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박지훈(중어중문 5): 작은 결혼식을 하는 것이 허례허식을 없애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결혼이 전통적으로 집안과 집안의 만남으로 여겨지는 중대사인 만큼, 양가 부모님과 배우자와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젊은 층에서만 퍼지고 있는 만큼 어려워 보입니다.

축의금 문화도 문제로 보입니다. 축의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축의금은 낸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부담도 되는 것이 사실인데, 작은 결혼식을 하면 축의금을 받지 못하니, 양가 부모님께서 쉽게 찬성하실지도 의문입니다. 당장 해결하려기보다는 서서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빈(언론정보 2): 연애를 포기한 많은 원인도 경제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SNS 에서 우스개로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젊은이들의 데이트 비용이 월 평균 23 만 8 천 원이라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경제가 더욱 발전하면서, 데이트 비용도 급증하게 되었는데, 경제적 수입이 부족한 20 대에게 이 역시 큰 부담으로 다가와 연애 포기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소정(사회복지 3):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재합니다. 실제로 데이트를 하다보면, 영화관이나 카페, 식당 등을 주로 가게 되는데, 전부 비용이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곳들입니다. 심지어 공원을 가도 돈이 들고는 합니다. 친구들과 놀러가려고 해도, 막상 갈 곳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연애와 결혼 등을 포기하는 것에는 팍팍한 일상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문화공간이 부재해 우리의 팍팍함을 풀 곳 자체가 없고, 스트레스를 풀면서도 비용 지출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등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가르치며 취미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는 문화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김수빈(언론정보 2):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삼시세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남성의 육아나 가사노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요즘은 남성 요리사들이 나와 요리하는 프로그램 포맷이 유행하며, '요리하는 남자'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육아 프로그램을 보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졌다는 친구들이 있었을 정도로, 공영방송 등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소정(사회복지 3):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활용에 앞서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육아 예능을 보다보면 TV 속에서 남성은 항상 가사에 있어서 서투른 모습을 보이고, 가사에 대해 익숙한 남성을 '슈퍼맨'처럼, 이색적으로 비추고는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남성의 가사노동을 '이벤트성'으로 비출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 20 대, 30 대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훨씬 좋은 옷을 입히고, 주말 내내 하루 종일 옆에 있어주는 모습 등은 오히려 비교를 통해 무력감과 좌절감 등을 불러일으켜, 나는 아이에게

저렇게 해줄 수 없으니, 아예 낳지 않겠다는 식의 생각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박지훈(중어중문 5): 사실 저는 3 포 세대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등장한 세대이기에, 그러한 젊은 층을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것을 고쳐야한다고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상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훨씬 오래 전에 이러한 '3 포 세대'의 문제를 겪었을 정도로 3 포 세대는 현재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국가의 젊은 세대에서 등장하는 변화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젊은 층의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사회복지 3): 서울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한 부담 완화의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의 압박과 결혼 비용의 부담 등으로 이른바 3 포 현상이 나타난 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선 노동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근로 환경의 개선이 제시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확대하며, 보육제도와 출산장려정책의 확충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결혼식 문화와 함께, 20 대의 문화 공간이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통한 인식개선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열심히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문화의 선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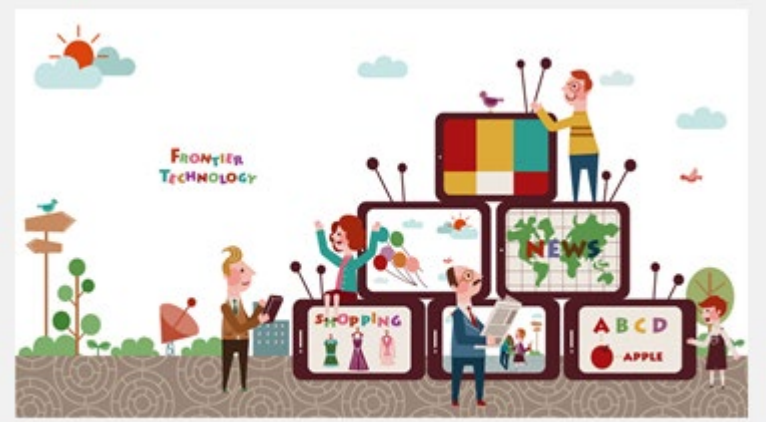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험기간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4 차 고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 94 차 월례토론회는 '생활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제는 생활문화 속 가장 중요한 가정 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정 문화 속 성 역할의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점차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사 노동에 여성 편중화 경향이 보이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준수(고려대 식자경 2): 가사 노동이 여성편중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방영되고 있는 많은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가정에서의 부성역할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아버지가 육아를 비롯한 가사를 전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청자들의 가정 속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가정 문화의 선진화를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가정문화의 선진화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미디어를 활용한 가정 문화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가정의 모습이 바람직한 영향만을 끼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주로 연예인들의 가정입니다. 이들은 고소득 상위계층들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기는 가정의 모습은 일반 가정들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괴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사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끼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위계층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반 시청자들의 진정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생활에 대한 환상만을 심어주어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허영심을 가져다주어 불필요한 사치스런 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심홍권(고려대 식자경 1): 저는 미디어를 통한 방안이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지용 학우분의 주장을 들어보니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방영된다는 의미 자체가 남성의 가사노동이 당연시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이벤트'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영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버지들의 가사 노동은 진행형으로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아닌 일종의 기획되고 연출된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가사 참여가 일회성임을 시사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가정에서의 남녀평등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수(고려대학교 식자경 2): 학우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니 부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중 미디어를 통한 인식 변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인식 변화노력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단, 진정한 의미로서의 가정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다듬어야 할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클리닉 형식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나가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맷으로 불화가 발생하는 일반인 가정들을 섭외하고 이들의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나가면서 바람직한 모습의 가정생활을 보여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가정 문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됨에 대한 교육은 부모들의 바람직한 가정문화를 이끄는 발판이 된다

김지용(고려대학교 식자경 2): 미디어를 통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특히나 가정의 주축인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등한 성역할을 비롯한 바람직한 가정 문화를 위한 '부모됨'에 대한 교육이 공교육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부모는 바람직한 가정교육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부모됨에 대한 교육은 물론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교육 과정 속에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래에 부모가 될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가정문화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심홍권(고려대학교 식자경 1): 좋은 의견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보조적인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사 노동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육아에 대해 맞벌이 부부가 부담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공립 보육원, 유치원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립 보육시설 같은 경우 비용지출이 상당하고 어린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 그 자격여부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들에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좋은 시설과 전문적인 보육인들을 갖춘 공립 보육 시설들이 하루빨리 확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낭비되는 복지 지출을 이러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절약된 비용으로 문화, 여가생활을 즐기는 등 가정문화가 더욱 선진화될 수 있습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정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모범적인 일반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어 공감을 일으키는 미디어의 활용, 바람직한 부모됨에 대한 공교육의 강화, 정부의 공립 보육시설 확충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4 차 고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좋은 의견들이 오갈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윤수정(연세대 정치외교 4):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청년 계층을 가리켜 '3 포세대', '5 포세대'라고 부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을 청년들이 점차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비용 결혼 문화와 결혼 후 여성의 경력단절, 육아 부담 등의 문제는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 모두를 포기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4 년 기준으로 여성 합계출산율(여성 1 인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25 로 조사 대상국 224 개국 중 219 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있는 한국에게 있어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오늘 토론에서는 '5 포세대의 결혼기피를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혜안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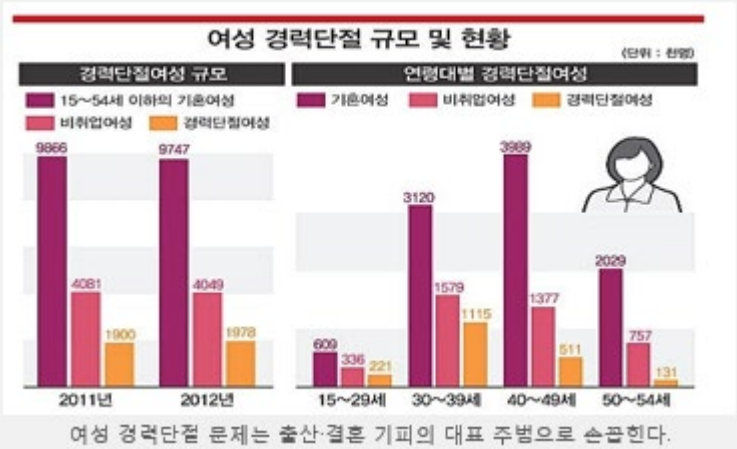
우선 저는 우리나라 결혼문화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허례허식을 걷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소위 '5 포세대'라고 불리 우는 청년들이 결혼은커녕 연애까지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취업난으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비싼 혼수문화와 성대한 결혼식 문화는 점점 더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외면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장려하고, 그런 문화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고금리의 결혼적금상품을 제공한다던지, 신혼부부들의 결혼식비용이나 혼수비용을 저금리 혹은 무이자 대출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허례허식을 버린 작은 결혼식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소엽 (연세식품영양 2):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몇몇 청년들 사이에서는 '셀프 결혼식'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스, 드, 메', 즉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고 불리우는 결혼식 준비 비용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요소들을 업체를 끼지 않고 스스로 준비함으로써 결혼식 비용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셀프 웨딩 사진의 경우 오히려 업체를 끼지 않고 자기 손으로 계획함으로써 보다 독특하면서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좋은 사진들을 남길 수 있어 호평받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적극 미디어나 SNS 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꼭 비싼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저비용으로도 좋은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김찬욱 (연세경영 3): 저는 특별히 결혼식 문화가 지나치게 고비용인 문제만으로 청년들이 결혼 자체를 기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결혼 후 경력단절'이라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서 더욱 결혼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후 직장 내에서 겪게 되는 견고한 '유리천장'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보다 나은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경력단절 문제는 출산·결혼 기피의 대표 주범으로 손꼽힌다.

이낭경 (연세생활디자인 4):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결혼 후 직장 내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출산'을 꼽고 있다는 것도 저 출산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육아휴직과 여성복 지를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합심하여 제도적으로 잘 확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기업문화가 성립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식(연세경제 3):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초혼 연령이 30.4 세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력 단절과 같은 생계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생물학적으로도 점점 더 임신에 불리해지는 높은 연령대로 초혼 연령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불임이나 유산 위험성을 증가시켜 점점 더 출산율 저하를 가속화하는 주범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 기업에서는 여성들의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 젊은 난자를 냉동시켜 보관할 수 있는 '난자동결'을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동시에 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주연(연세언더우드 2): 한편 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결혼은 청년들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일인 경우가 많은 만큼 아무리 청년들이 작은결혼식을 지향한다고 해도 그걸 실제 행동에 옮기기에는 가족의 눈치를 보느라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도한 축의금 문화는 작은 결혼식 정착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다.

박서영(연세언더우드 1):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축의금 문화'가 작은 결혼식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위 어르신들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결혼식'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냈던 축의금을 자식의 결혼식을 통해 회수한다는 개념이 뿌리깊이 박혀 있어 소위 조촐하게 지인들만 모아놓고 하는 작은 결혼식을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 기부 지출 비용 중 축의금, 부조금 등이 차지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하네요.

양현식(연세문화인류 3): 저도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도 축의금 문화를 외국처럼 혼수품 리스트 문화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외국의 경우 주로 절친한 지인들끼리 모여 조촐한 작은 결혼식을 열 때 지인들에게 미리 필요한 혼수품 목록을 보내면 그에 맞게 혼수품을 사람들이 구매해 주는 형식으로 결혼 축의금을 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낭비도 없이 필요한 혼수까지 마련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결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현종(연세전기전자공학 4): 저는 이런 작은 결혼식을 위한 논의들 모두가 결혼식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결혼식과 혼수 장만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결혼 플래너를 양성해 무료로 지원해준다면 보다 작은 결혼식 문화 정착이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초혼 신혼부부들의 경우 정보를 잘 몰라서 더 비싸고 허례허식에 지나지 않는 결혼 문화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윤지(연세정보인터렉션디자인 3): 저는 결혼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후'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가족애'와 같은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것 이외에도 1 인 가구 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들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현(연세의예 2):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1 인 가구에 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줄 수도 있겠고, 다세대 가족만이 들 수 있는 특별한 고금리 펀드나 적금 같은 혜택도 준비할 수 있겠죠. 보험 혜택에 있어서도 차등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경(연세언더우드아시아 3):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지원된다면 좋을 것 같네요. 결혼적령기 여성에게는 아까 말한 난자동결 혜택을 무료로 제공한다던지, 아니면 결혼적령기 남녀에게 결혼을 위한 재무설계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단계적으로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맞선지원, 난자동결 등 보다 적극적인 결혼·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이수윤(연세정보인터렉션디자인 3): 공감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5 포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데는 애초에 '연애' 또한 기피를 하다 보니 결혼은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신뢰성 있는 무료 국비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해 결혼적령기 남녀에게 무료로 맞선이나 소개팅을 주선하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윤수정(연세정치외교 4): 다들 활발한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 개진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특별히 5 포세대의 결혼 기피를 줄이고 작은 결혼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많이 제시된 것 같은데요. 사회초년생들에게 고금리의 결혼적금 상품이나 혼수비용 무이자 대출, 또는 결혼 적령기 남녀에게 무료 재무설계를 해주는 등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 '셀프 결혼식'과 같은 작은 결혼식 문화 정착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요. 동시에 한국의 결혼은 '개인'이 아닌 '가족'의 일로 여겨지는 만큼 어른 세대들의 인식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움직임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축의금 대신 혼수품 리스트 문화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고요.

동시에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여성 경력단절의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와 올바른 기업문화 형성에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노산 위험 방지를 위한 '난자동결 무료 지원'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 제안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 인 가구 보다 다세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각시키고 결혼 '후'에도 그 혜택이 유지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데 많은 공감이 모아졌습니다. 끝으로 국비 결혼정보회사 등 결혼을 위한 연애 단계 또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재미있는 의견도 제시되었네요.

이런 구체적인 정책 제안 하나하나가 모여 한국의 선진생활문화 수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신 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그럼 이상으로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육아휴직이 권장되어야 한다.

이정진 (국제관계 3) :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낮은 출산율과 결혼율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생활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출산율과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개인적·사회적 방향은 무엇인가' 로 소주제를 잡았으니,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출산과 결혼에 대한 부담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남성의 가사분담에 대한 거리감이, 사회적 측면에서는 결혼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방해와 기업의 비협조적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성에게 육아 휴직을 의무화함으로써 남성의 가사 분담을 돕고 여성의 가사일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내에 보육, 양육 센터를 장려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시훤(국제관계 3) : 저는 우선적으로 출산율과 결혼율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딩크족(DINK :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과 같이 결혼을 한 후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하여 부담감을 갖는 것은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결혼식에 드는 비용의 탓이 크게 작용합니다.

황주영(국제관계 3) : 김시훤 학우의 의견처럼 결혼식 비용이 결혼의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에 대한 부담이 큰 가장 큰 이유는 결혼식 비용뿐만 아니라 결혼 후 집 비용이나 생활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상적인 결혼 모습만 나오는 방송 매체는 실제 결혼에 부딪쳤을 때 오는 좌절감과 패배감을 팽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고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훤(국제관계 3) : 동의합니다. 또한 먼저 여성의 경우는 사회진출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남성의 결혼을 막는 요인이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결혼을 할 경우 집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신혼부부들의 경우 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부동산 정책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황제(국제관계 3) :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수 임대주택과 같은 정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출산율 장려 정책 보조금에 앞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양식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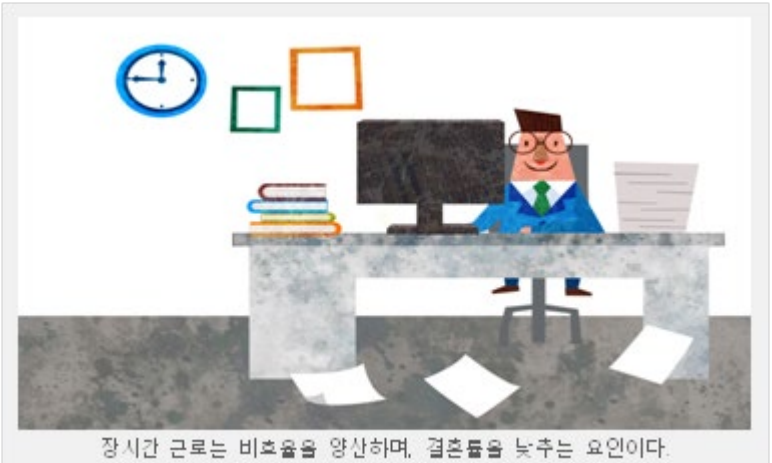
출산 후 비용보다 출산 전 부부 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가 활동을 개인적인 것으로 다루지 않고 국가적으로 다룬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김시훤(국제관계 3) : 아이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비와 과열된 경쟁심 또한 출산율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것이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출산 이후에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점차 증가하지만 월급이 오른다거나, 경제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지석(국제관계 3) :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결혼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기업의 고정관념 또한 고쳐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방해하여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도록 만듭니다. 추가적으로 지나치게 긴 장시간 근로문화도 결혼률을 낮추는 주요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시훤(국제관계 3) : 장시간 근로문화는 결국 한 개인의 야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근을 한다고 한다면 개인이 1.5 배의 일을 하지만 그로 인해 받는 야근 수당, 총 월급은 1.1~1.2 배이다. 따라서 이를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용하는 인력에 비하여 기업적 효용이 매우 큽니다. 이것이 장시간 근로문화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를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황제(국제관계 3) : 장시간 근로는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기업적 잣대를 세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할 당시의 피로도, 개인적 효율성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여러 요인을 적용하여 차등적으로 야근수당을 준다면 장시간 근로는 기업 입장에서 손해이므로 차차 줄어들 것입니다.


장시간 근로는 비효율을 양산하며, 결혼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김시훤(국제관계 3) : 나아가 저는 야간 수당의 도입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야간 수당을 통해 돈을 더 벌고 싶다거나,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요인들로 야간 수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수당은 시간에 비해 비효율을 낳고 기업적 손해를 일으키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의 폐지가 장시간 근로문화를 없애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황주영(국제관계 3) : 김시훤 학우의 말처럼 야간 수당의 장단점 모두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폐지되기보다는 악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도를 잘 찾아야 합니다. 성과제는 삶의 피폐함과 일에 대한 과도한 몰두를 가져오고, 반대는 지나치게 안도감을 불러일으켜 공기업과 같은 폐해를 낳듯 중도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김세원(국제관계 2) :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독신을 생각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여성의 결혼은 여성 자신에 대한 투자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주영(국제관계 3) : 만약 남편이 모든 가사를 담당하고 여성이 경제적 역할을 담당한다하더라도,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직까지 남아있으므로 이것부터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황제(국제관계 3) : 황주영 학우의 말대로 남성이 가정 역할을 담당한다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남성이 가정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회사의 시각에서 결혼한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개개인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하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황주영(국제관계 3) : 덧붙여서 현실적으로 육아와 직장에 대한 것을 함께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육아와 함께 일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는 비단 결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세원(국제관계 3) : 황주영 학우의 말처럼 육아를 한 후에 일을 하거나, 이러한 현실에서 출산율을 높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남성의 가사분담과 여성 스스로의 일에 대한 욕심은 별개입니다. 가사분담을 한다고 해서 여성 스스로의 자기주도적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김시훤(국제관계 3) : 이정진 학우가 내세운 남성 육아 휴직과 직장 내 보육센터는 단편적인 해결책입니다. 출산율과 결혼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모든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들은 일종의 복지이므로 세금이 높아져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황주영(국제관계 3) :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출산율 1 위 국가는 어떠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인도와 같은 개도국이 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행복할까요? 이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에 맞추어 고령자들을 위한 산업은 따로 진행하면서 새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한 산업은 따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황제(국제관계 3) :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출산율에 주목하듯, 5 년, 10 년의 계획이 아니라 20 년 길면 50 년까지의 장기적인 정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설사 정권이 바뀐다하더라도 기초적인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출산에 관한 정책은 일관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진(국제관계 3) : 낮은 출산율과 결혼율에 대하여 문제점과 해결책을 들어보았습니다. 김시훤 학우는 야간수당의 폐지를, 이황제 학우는 부부를 위한 여가지원비를, 황주영 학우는 정권에 관계없는 일관적인 출산 정책을, 김세원 학우는 여성의 장래를 위한 투자를, 이지석 학우는 기업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기업적 차원에서 바라본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눔으로써 앞으로의 정책 제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④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회식문화 개선 등 기업문화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생활문화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생활문화 중 가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기업문화의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6 시 정시에 퇴근하는 일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출산과 양육은 꿈도 못 꾸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의 유형을 다양화 시키며 늦은 퇴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회식문화 역시 낮에 회식을 하거나 문화행사와 같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회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사내 기업에서 운영하는 유치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업 내에 같이 있으니깐 휴식시간에 잠시 들릴 수도 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1): 직원의 복리후생을 높이는 차원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일-가정 양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의 애사심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근로문화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 또한 증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사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혜(이화여대 교육 2):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실행되고 있는 정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출산전후 3-5 일 정도의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급여의 40%를 받으면서 1 년 정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 배우자나 부모 돌봐야 할 때 휴직하는 가족돌봄휴직제도, 직장 어린이집 제도, 공공 보육시설 운영 제도 등 여러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있다고 해도 사용할 때에 눈치가 보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이와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처음부터 잘 뽑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배우자 휴가제도 등을 의무화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매장당하다시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출산 및 육아 휴가제도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여성 할당제가 부작용 많다고 하지만 이런 장치마저 없으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경우, 지금 보다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취직하기 힘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그 책임이 여성에게 지워져 있으며, 마치 일-가정 양립을 하려고 하는 여성 개인의 책임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남성들의 육아휴직제도 등을 통하여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나아가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빈(이화여대 교육 1): 제 생각에는 제도를 의무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도가 아직까지 의무화 안 된 이유가 기업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들과도 더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은혜(이화여대 교육 2):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복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제도 의무화 등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중소기업이 차별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겠군요. 그럼 가정문화의 측면에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처럼 엄마 휴식의 날 캠페인이 필요하다.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엄마가 파업했다'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가사분담에서 남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처럼 엄마가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가사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아빠가 양육하거나 가사 노동하는 날을 만들도록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재미있는 의견이네요. 최근 미디어를 통해 가정적인 남자들의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는 만큼 이런 캠페인을 통해 남자들도 가정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유진(이화여대 교육 1): 미국 고등학교에서 미혼모 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기 인형을 며칠동안 돌보는 프로그램을 담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아기를 돌보면서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고, 육아휴직을 충분히 할 만하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참신한 의견이네요. 아니면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 사회에서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가 직장에 가있는 동안 돌봐주는 대신 약간의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회사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했던 기간 동안의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경력이 단절되는데 그것을 메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육아휴직이 단순히 노는 기간이 아니라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혜(이화여대 교육 2):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일 -가정 양립이 아니라 일이나 가정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립이 가능한 초등교사가 인기 있는 것 아닐까요?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슬픈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크게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와 가정문화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배우자 휴가제도의 의무화, 엄마 휴식의 날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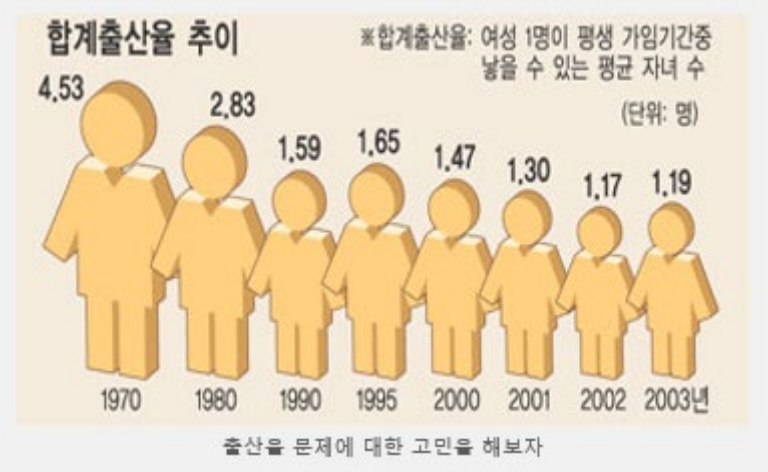
아기인형 돌보기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교육, 노인인력을 활용한 육아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참조 : https://www.youtube.com/watch?v=iNKJoH71Fe4

⑤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승찬 : 이른 아침부터 토론을 위해 참가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문화를 어떻게 개선 하느냐'인데요? 최근 원빈과 이나영의 간소한 결혼식이 화제가 된 것처럼, 과도한 결혼비용을 개선하고 집안내부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문화의 선진화가 저출산 탈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의견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생활문화를 개선하려면 국민이 문제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문제점을 깨달으려면 언론을 잘 활용해야 하며 언론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해야 국민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동건 : 언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공감대 혹은 명분도 함께 쌓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정책이 성공합니다,

김승찬 : 의견 보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건 학우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건 : 저는 저출산과 생활문화를 엮은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료를 보니 가족에게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생활문화는 선진화가 아니라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선진화라는 말을 파헤쳐 보면 우리가 후진적이라는 뜻도 됩니다. 즉 우리가 아프리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생활문제보단 경제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식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례허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옆 나라인 중국보다 간소한게 우리나라 결혼식입니다. 중국의 경우 한 자녀인 경우가 많으며 그 자녀의 한 번 뿐인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루어 주고 싶어합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치루어 주고 싶은 것은 세계어디든 똑같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중국이든 어디든 같습니다. 결혼 비용이 높을지 몰라도 축의금으로 상당부분 상쇄가 되기도 합니다.

사용된 지표를 보니 통계를 잘못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의 가사 시간을 다룬 자료중 2008 년도 자료가 있는데 이 시기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직장인들이 가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배경을 무시하고 남자가 가사일에 시간투자를 잘 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했지만 결혼비용을 줄이는 것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나 사상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작은 결혼식은 다른나라 문화 풍토의 결혼식인데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가 다른 배경인 정책을 시행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김승찬 : 아주 자세한 의견이였고 자료에서 나온 오류까지 지적해 주셨네요. 문화적인 배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음은 박진호 학우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진호 : 저도 결혼의 고비용 문제는 인정합니다. 이동건 학우의 말대로 사회문화 이해 안하고 진행하는 것은 오류라고 봅니다. 게다가 세상은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통계와 달리 남성들도 최대한 집안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해준 자료를 보면 양성평등이 여성피해적인 관점에서 적혀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진정한 양성평등은 여성피해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료에서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자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업무시간을 줄이자면서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 3 명이 하는 일로 바꾸는 겁니다.

근로시간을 줄이자면서 근로시간에 자유롭기 힘든 비정규직을 만드는 겁니다. 근로문화를 개선하자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려는 행위에 모순을 느낍니다.

김승찬 : 박진호 학우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한 쪽에 편향된 부분과 경제계의 냉철한 현실을 지적해주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작은결혼식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효과가 없는지 짚어보면 우리 문화토양에 대한 검토없이 정책을 실행하니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토의가 필요하다.

결혼문화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다곤 할 수 없지만 왜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언론을 활용하든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충분히 효율성있는 방법이지만 왜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문화 개선전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하며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⑥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아버지도 집안일을 함께한다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김한준(공주교대 4) : 지금부터 KELF(Korean Economic Leaders Federation) 한국경제리더연합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불구하고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만 삶의 질과 만족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지출 면에서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여성의 가사분담시간이 남성의 6.6 배에 달하고, 1 인당 연 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 중 2 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자살률이 OECD 최상위권을 차지하였고,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권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번 연구모임에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생각에는 여성들의 높은 가사부담과 낮은 사회참여율 등 양성불평등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사회참여율은 미국, 일본에 비해 10%나 낮고, 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158 분으로 남성 평균인 26 분의 6.6 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내 요리동아리나 조리관련학과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직장에 찾아가는 요리교실을 만들어 직장인과 기업 임원진들에게 요리 및 가사업무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요리나 가사업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가사분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다혜(이화여대 중어중문 1) :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만큼 남성들이 가사를 도와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직장에 찾아가는 요리교실을 만든다면 가사노동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무여건상 가사노동과 가정의 소중함을 요리교실이나 가사업무강좌를 열어 그 중요성을 일깨운다고 해서 완전히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직장 내 근무여건의 개선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퇴근시간을 정시에 준수하고, 회식을 자주하는 문화를 지양해야합니다.



배은성(서강대 경제 2) : 우리나라만큼 야근을 많이 시키고 회식을 자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선 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녁에 술을

마시면서 하는 것보다 업무시간의 일부인 점심시간에 커피 브레이크를 갖는다거나,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직원들 간에 친목을 다지는 것이 진정한 직장 내 회식문화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감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스마트폰 문자, 톡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하는 관행도 지양해야합니다. 최근 스웨덴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업무의 연장이며, 이에 대해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해 부담이 커질 것이고, 정시 퇴근 문화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김한준(공주교대 4) : 남성의 가사분담율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요리교실이나 가사노동강좌를 통해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1 인당 노동생산성이 OECD 국가들 중 23 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이유가 근무 외 수당을 벌기 위해 야근을 자처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정시퇴근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먼저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보다 성과급 지급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여성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역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은성(서강대 경제 2) :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들의 경제참여율이 약 55%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10% 넘게 뒤쳐진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중 임신, 출산 등의 가정문제로 휴직을 할 때 계약을 파기하고 해고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도 임신, 출산, 양육은 승진 및 근무 지속에 악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근무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임신, 출산, 양육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다혜(이화여대 중어중문 1) :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은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사원들의 경우 임신, 출산, 양육 기간동안 계약을 보류하고, 복직 후에 나머지 계약기간을 이행하도록 하고, 정직원 들의 경우에도 휴직 후 복직을 허용하고,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김한준(공주교대 초등교육 4) : 여성근로자들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의 하나가 가정 문제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출산, 육아휴직기간을 보장하고, 장기휴직한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응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한 비용이 장기적으로 큰 이익이 돼서 돌아온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삼포세대라고 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자신의 여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삶의 만족도 지수 또한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과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반석 (명지대 경영 3) :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와 시선이 부정적인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도 정규직 못지않은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와 시선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절반 이상의 비정규직들이 4 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4 대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무조건 한 곳에 정착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자신의 전문성만 있다면 직장을 옮기고, 계약직으로 다녀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선호도가 지나치게 높은데 이러한 지나친 선호의 편중은 취업재수생과 삼포세대를 양성하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재취업 활성화로 노동탄력성을 높이는 것은 어떨까요?

김다혜(이화여대 중어중문 1) :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노동의 탄력성이 높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 및 권고사직을 많이하지만, 이들이 재취업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오반석(명지대 경영 3) : 요즈음 학내 벤처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학생들만 참여하는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학내 벤처기업을 만들면서 자문이나 컨설턴트로 퇴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도, 재취업율을 높이고, 학내 벤처기업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재취업 일자리를 높인다면 자연스럽게 노동의 탄력성도 높아질 것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또한 완화되기 때문에, 삼포세대나 취업재수생들이 줄어드는 효과를 줄 것입니다.

김한준(공주교대 4)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생활문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직장 내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찾아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의 자체적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직장 내 근로여건을 개선한 기업들에게 정부나 지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하고 우리 대학생들도 직장인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실을 개설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사 분담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단순히 경제적 선진화 뿐만이 아니라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찾음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문화의 선진화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5 월 31 일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제공해 주신 모든 학우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⑦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지금부터 원광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내주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GDP 13 위 및 국민소득 2 만 불이 넘을정도의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에 속합니다. 하지만 생활문화에서는 우리는 아직 중진국 수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생활문화에서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의 기본토대가 되는 근로문화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근로문화의 변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들어가는 회사가 이러한 근로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근로문화는 무엇입니까?

이희주(원광대 국제통상 2) : 박재형 학우가 재밌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전 우선 요즘 취업난이 심각한 만큼 취직만 시켜줘도 '감사합니다' 할 거 같습니다. 제가 가는 회사는 서로 맞춰주는 근로문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회사와 개인 간의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배상경(원광대 국제통상 4) : 저도 이희주 학우와 마찬가지로 우선 취직하는거 자체에 고마워 할 거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회사는 일에 맞는 적절한 보상과 회사 내에서 친목도모를 위해 동아리가 활성화 돼있는 근로문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저도 취직을 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장 먼저 가질 거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회사에는 서로 존중해주고 수직적이고 딱딱한 관계보다 수평적이고 능동적인 관계를 토대로 근무하는 근로문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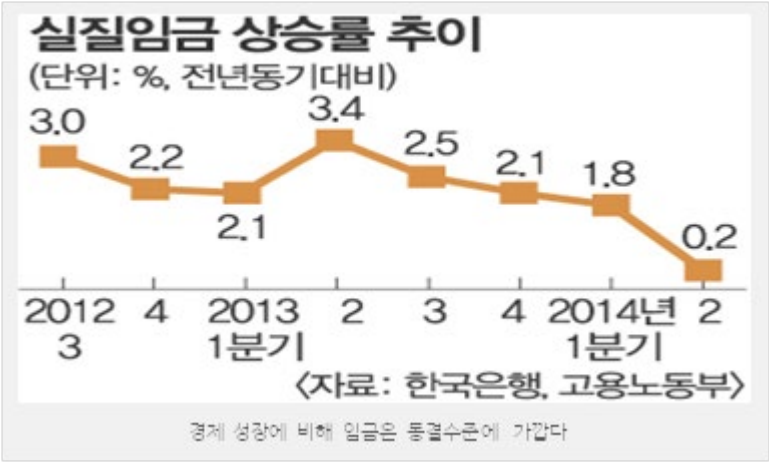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OECD 중 멕시코에 이어 2 번째로 근무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과 효율을 보면 미국의 절반, OECD 중에서도 평균 아래에 해당합니다. 1 인당 생산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인데요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배상경(원광대 국제통상 4) : 저는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집단주의와 일에 대한 의욕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단주의로 일에 대해 협동보다도 파벌을 만든다던지 해서 서로 심한 견제를 하는 것도 원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저는 군대문화가 한 몫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군대를 갔다와서 알겠지만 군대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어떠한 일을 완료하면 휴식이 아닌 다른 일을 또 주는 등 열심히 하면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회사에서도 적용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이희주(원광대 국제통상 2) : 저는 임금문제에서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꾸준히 계속 발전중입니다. 기업들은 꾸준히 크고 있지만 그에 반해 임금상승률을 보면 거의 제자리선에 해당합니다. 임금상승률이 제자리수준인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문화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야 하며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화의 방안과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변화의 방안 생각하신거 있으십니까?



흔히 회식하면 생각나는 것은 술을 먹는 장면이다

배상경(원광대 국제통상 4) : 정시퇴근을 당연히 하는 인식이 필요하며, 장기 근로시간에서만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과도하면서 잦은 음주회식 등에서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회식의 주 목적은 친목도모 및 부서내의 화합 등이 이유입니다.

친목도모와 화합에 음주회식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문화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시설등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변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누나 회사만 하더라도 회사자체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서히 근로의 질을 높이면 근로문화도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주(원광대 국제통상 2) : 배상경 학우의 의견에 공감하며, 저는 정시퇴근이나 회식문화등은 한 번에 바뀌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간부급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생각하며, 정시퇴근을 못하고 야근을 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적절히 해주는 것도 근로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뭔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시퇴근 이벤트를 통해 서서히 정시퇴근이 당연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배상경(원광대 국제통상 4) : 정시퇴근의 인식변화를 위해 회사에서 정시퇴근 이벤트를 해보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를 통해 정시퇴근을 유도하며 인식을 서서히 바꿔 나갈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저는 우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회사의 경영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정시퇴근을 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것보다도 홍보를 해준다던지 기업평을 좋게 해주는 인센티브를 해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경하는 선진국들의 문화들은 한 번에 생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선진국들도 다들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천천히 바뀌어서 지금의 선진문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급하게 따라갈 것이 아닌 천천히 변화하며 문제점을 고쳐가며 우리나라 방식의 선진문화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문화의 변화의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와중에도 오늘 모임에 나와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⑧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기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로 이대로면 2300 년에는 국가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래가 매우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고,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신혼부부

먼저, 제 의견을 밝히자면 저는 현재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와 보육 문제라고 생각하여,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혼부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보급하고, 안전하고 믿을만한 보육시설까지 갖추게 된다면 어떨까요?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그 지역으로 찾아올 것이고, 이는 지역 발전과 연결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보충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세요.

이정아(숙명여대 영어영문학): 저도 박현진 학생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조성보다는 국가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수를 늘리고 특히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주거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불어, 국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정책을 강화한다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각한 수준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김정환(홍익대 토목공학):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결혼 및 출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간 때문이라고 봅니다. 야근 및 회식문화가 당연한 회사 문화로 자리매김한 현재 아이를 키우기 위한 부모들은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정시 퇴근을 하기 위한 정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저도 김정환 학생의 의견에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에 대하여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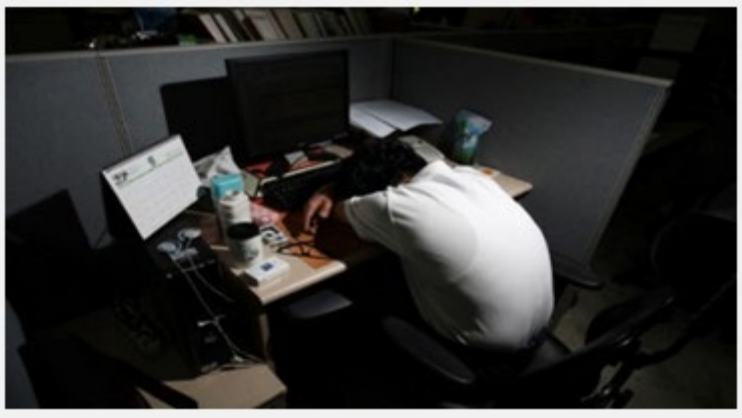
따라서, 기업 문화의 개선은 상당한 시간이 들게 될 것이므로,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정아(숙명여대 영어영문학): 저는 김정환 학생의 의견을 조금 보충하고자 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부모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임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으로 이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쪼개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2 시간을 일하고 12 만원을 받았던 사람에게 하루 8 시간만 일하게 하는 대신에 7 만원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준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식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시간당 급여도 조금 줄이도록 하고, 그렇게 기업 입장에서 부족해진 시간을 대체 인력의 고용을 통해 채운다면 어떨까요?

기업도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자도 물론 급여는 줄어들겠지만 그만큼의 시간을 확보하여 아이가 중요한 시기에 집에서 아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고통, 야근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하지만, 현재 기업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칼퇴근을 못하는 이유는 돈을 조금 받아서가 아니라 회사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저는 근무시간을 쪼개는 것보다는 노동자가 부당하게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홍익대 토목공학):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말씀드린 정책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보장하고 직원복지가 잘 갖춰진 기업을 찾기 위하여 정부가 정기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0%의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혜택을 준다면 기업 문화가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신선한 접근이네요. 저도 김정환 학생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을 생각하는 기업에 상을 내리는 방향이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견으로 신혼부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활성화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하여 국문주택의 수를 늘리고 특히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주거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정책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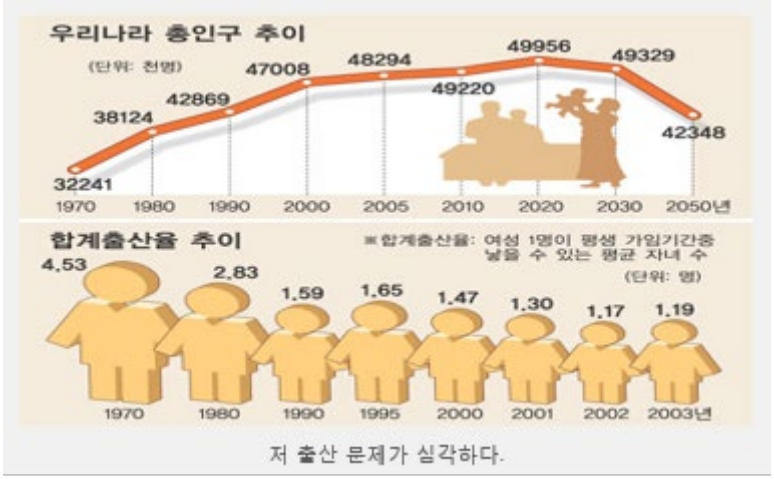
두 번째 의견으로 모든 기업이 정시 퇴근을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근로시간을 쪼개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자가 부당하게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충의견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보장하고 직원복지가 잘 갖춰진 기업을 찾기 위하여 정부가 정기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명단공개 및 혜택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성을 정부 차원에서 깨닫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우리 대학생들은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토론자분들 모두 대단히 감사합니다.

⑨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백송희(단국대 무역 2): 지금부터 단국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5 포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연애 결혼 출산과 더불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바라보았을때 마냥 웃을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과 출산의 포기가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해야만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가정 공동체를 넘어 건전한 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비용의 결혼식 같은 허례허식이 사회에 만연해있다.

우선 저는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은 성대한 결혼식 및 허례허식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다 요즘 결혼식 비용 최소 1 억이라는 믿지 못할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비용의 부담되는 결혼식이 결혼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혜선(단국대 무역 2) : 이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결혼식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중대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의축하를 받아야 하고 남부럽지 않게 성대하게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성세대들의 고정관념은 너무나도 확고해서 이를 타파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결혼 적령기인 사람들은 주로 2-30 대는 기존의 관습에 의문을 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기존의 성대한 결혼식이 불필요함을 잘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송희(단국대 무역 2): 예를 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윤수진(단국대 무역 2) : 아무래도 2-30 대는 sns 나 영상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원빈 이나영의 결혼식 다들 보셨나요? 그 누구보다도 성대한 결혼식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스타의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원빈의 고향에서 친지들만 모셔놓고 아주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인상깊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소담하고 아름다운 결혼이 저를 포함한 다른 2-30 대의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에게도 예쁘게 보이고 작은 결혼을 꿈꾸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 결혼식을 보고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축하보다는 뷔페음식과 시끌벅적함 속에 있는 현재의 결혼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였나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문혜선(단국대 무역 2) : 저는 축의금 문화 또한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데 방해가 되는 대표적인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나중에 있을 결혼식을 위해 저축마냥 낸 축의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게 부담된다는 저희 사촌언니의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백송희(단국대 무역 2) : 맞습니다. 그 자체의 성스러움과 아룸다움은 오간데 없고 오로지 북적거림과 뷔페의 메뉴에 대한 평가만 가득한 허례허식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축의금 인습인데 이를 타파하지 않으면 작은 결혼식 문화는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비가 상당히 고비용으로 측정되었다.

윤수진(단국대 무역 2) : 그렇지만 저는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결혼의 비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비용은 이후의 문제이고 결혼 이후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비용의 무게가 결혼을 가장 기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결혼을 하지 않을거라는 친구들과 최대한 늦게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유를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자신의 일을 더 하면서 커리어를 쌓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결혼 이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회사에 강력한 입김을 넣어 육아휴직과 여성복지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제도가 없는 회사도 있지만 제도가 유명무실한 회사가 정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들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눈치를 봐야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문혜선 (단국대 무역 2) : 또한 양육비 보조도 정부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가정을 도와주는 복지를 넘어 1 인 가구보다는 2~3 인 가구의 조세혜택 등의 각 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한명도 안낳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녀를 낳으면 주는 혜택을 매우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현재 부담이 되고 있는 양육비용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송희 (단국대 무역 2) :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결혼 장려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 토의해 보았는데요, 허례허식 타파를 통해 작은 결혼식을 장려해야 한다는 방법과, 정부의 조세 혜택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송민상 (중앙 정치 3)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선진화 연구모임을 위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렸듯 지난 5 월 21 일에는 '생활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재)한국 선진화포럼의 95 차 월례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성과 여성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양립가능한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맡춰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혼 여성의 90%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경력단절이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공부문 직종에서 여성의 의무 고용 쿼터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시켜 나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으로는 어떤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강현구 (중앙 중문 3) :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해 보상을 따로 주면서까지 여성의 경제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기업가들이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남녀 사이에서 특별히 남성을 더 채용하진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20 대의 인식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지, 남녀의 쿼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뽑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문직의 경우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뽑히고 있지 않은가?

한국 여성의 경우 취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현재 취직고용시장이 공대위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공대를 기피하면서 취직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여성들이 실제 종사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활동 집계에 빠져있는 경우도 많다. 개인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피부미용, 프리랜서, 과외 교습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집계하기가 어려워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호길 (중앙 전전 3) :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고용 시장의 확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군대에서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나다보니 기업은 1 차적으로 남성을 더 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생기면 휴직 수당만 챙기다 관두는 경우도 많고, 생리 휴직 등의 악용 사례도 대학 조직 내에서 조차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남성의 경우 이에 비해서는 기업의 관점에서는 책임감이 더 강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성 의무 승진 할당제와 같은 정책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만 불러일으켜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여성이 많이 뽑힌다 하여 남성 할당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성별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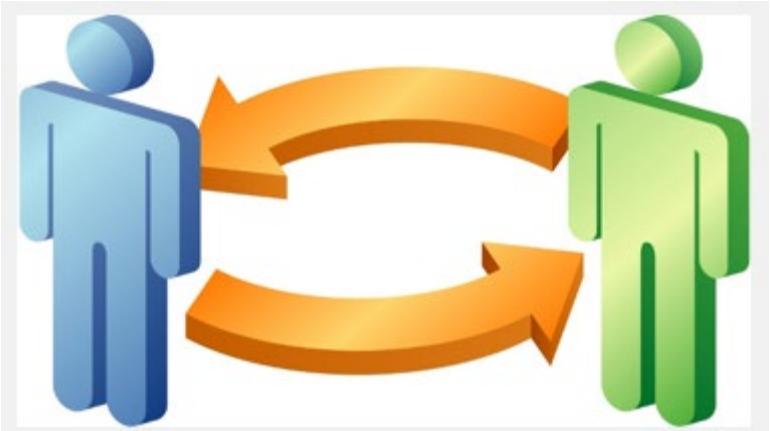
신혜원 (중앙 중문 3) :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취직을 '안'하는 측면도 있지만 '못'하는 측면이 더 크다. 하지만 기업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여성부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우월적인 특권을 요구함으로써 이런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여성부는 영문명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인데 왜 한자는 여자 여(女)자를 쓰는가?

페미니즘은 남녀의 능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행하는 운동인데, 그렇다면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을 강조해야지, 여성에 대한 특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지음 (중앙 영문 3) : 아내가 출산 시 육아휴직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직장인의 경우 눈치가 보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대체하려는 인력이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를 위한 고용인과 기업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눈치가 보인다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택 근무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유창 (중앙 중문 2) : 재택근무 추가적 비용도 필요하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크다. 재택에서 하는 노동 결과와 직장에서 하는 성과를 동일한 수준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남녀, 기업, 국가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강현구 (중앙 중문) : 사소한 곳에서부터의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전통적인 부계사회를 탈피해 나가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과서 삽화에서 '엄마는 집에서 밥하고 아빠는 퇴근하는' 등의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색채부터 지워 나가야 한다.

또한, 정규교육과정에서 '앞으로 남녀의 구분이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이다'와 같은 미래형 어구의 서술보다는 이미 현실화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유창 (중앙 중문 2) : 솔직히 우리나라도 현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그 자체가 미비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눈치보기' 문화가 존재하는 한 현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 하더라도 한계가 뚜렷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 연차 쓰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데 육아휴직 등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신혜원 (중앙 중문 3) : 사람의 인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편익, 단기간의 이익 손실 등에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아모레 퍼시픽, 유한캠벌리 등 사회적 활동 많이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가정적인 이미지 구축은 분명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여성 고용인에게도 직장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를 위해 회사 안에 육아시설을 갖춰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 보모 고용, 유치원 구축 등을 통해 아이를 옆에 두고 일할 수 있다면 여성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애를 낳고 기업을 관두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집에다 애를 혼자 놓고 올 수 없는 모성애 때문이다.

송민상 (중앙 정치 3) : 기본적으로 엄마만 아이를 직장에 데려가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인식의 전환이 있으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편견부터 빠르게 탈피해 나가야 한다.

한편, 앞서 언급된 육아 휴직이나, 보모가 고용된 놀이방, 유치원 등을 잘 갖춘 기업에게는 세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전후 일정 기간에는 4 대 보험 등의 기업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기업입장에서도 출산이나 양육 등으로 발생하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고정비용과 인력의 부재를 감내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창 (중앙 중문 2) :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경험을 겪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완성있게 고발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육아 휴직 등의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송민상 (중앙 정치 3) : 경력직 여성 재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 전 가지고 있던 경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일이 아닌 기존에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양질의 재고용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다른 분야로의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 취득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해당 여성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재교육 제도의 내실화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강현구 (중앙 중문 3) : 실질적으로 경제참여의 주체인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의체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국민들의 합의와 논의, 이해납득을 형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성부가 지금의 방식처럼 일방적으로 여성우대정책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세칙 합의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민상 (중앙 정치 3) : 결론적으로 지금은 가정에 중심축이 맞춰져 있던 여성들을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입기이자 과도기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대해 유교적인 잣대를 들이밀며 그 자체로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게 되었는지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 역시 여성에 대한, 근본적으로는 고용자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침으로써 고용자들이 가정에 안정감을 느끼고 나아가 기업에 애사심을 느끼며 직장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경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제시된 개인과 기업 차원의 인식의 전환, 육아휴직의 내실화, 경력직 여성 재고용 방안, 성차별 내부 고발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 남여 사회통합 논의체의 형성, 교육 과정의 개편 등이 전반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에 대한 인식과 권리가 가시적으로 향상되어 온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대한 세칙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만 잘 형성하여 나간다면 이에 대한 미래도 밝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끝까지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중앙대 선진화 연구모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⑪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송소담(서경대 공공 4): 지금부터 서경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귀한 시간 내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 포 세대를 넘어 7 포 세대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젊은 계층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5 포 세대나 7 포 세대라는 단어처럼 젊은 계층이 포기해야 하는 것에는 '결혼'이 포함되어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결혼가족문화는 일상의 안녕과 행복의 원천인 결혼을 위해서는 희생과 높은 비용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신뢰받고 품격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과는 멀어지고,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 극복에는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과 저출산 문제 극복의 기본이 되는

‘결혼’을 중심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한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미디어를 통한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개선’과 ‘공인들이 앞장선 간소화 결혼식의 확대를 통한 의식개선’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들에게 집중된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남성의 가사참여 프로그램이나 아이돌봄 프로그램과 같은 미디어를 통하여 남성에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그들도 가사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식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남성이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에 대한 막중한 비용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자연 속 결혼식이나 소수 지인들만 초대하여 진행하는 간소한 결혼식을 확대하여 결혼식이 꼭 화려해야만 한다는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한다면 남성들의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소연(서경대 공공 4):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저는 유명 연예인들의 허례허식을 뺀 결혼식이 젊은이들의 의식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에 동의를 하는데요.

최근에 젊은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소박한 결혼식 의뢰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명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이 사람들의 의식을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바꿔준다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준희(서경대 경영 3): 저는 송소담 학우와 권소연 학우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무엇보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젊은이들에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신부수업처럼 신랑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수업으로 남성들의 가사 및 돌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훈련시키면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인 '막중한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이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은 자발적으로 하려는 남성들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무료수강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일정 과정 수료 시 '결혼비용 일부지원'이나 '신혼부부 주택마련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송소담(서경대 공공 4): 신랑수업을 일정 과정 수료할 경우 관련된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매우 신선하네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소연(서경대 공공 4): 저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것이 결혼에 대해 비관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삼시세끼'같은 프로그램들은 결혼 후의 행복한 모습 위주로 방송하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다룬 프로그램이나,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가진 일명 아침 '막장 드라마'에서는 결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부터 심한 경우 이혼까지 가는 내용을 너무 쉽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자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은 자연스레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결혼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언론매체가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내용의 드라마나 프로그램, 혹은 공익광고 등을 통해 결혼에 대하여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하여, 국민들의 의식형성에 도움을 주면서 잘못된 의식은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매체는 자극적이고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내용을 방영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보다 발전되고 선진화된 국가를 위한다면 어느 정도는 따뜻한 방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소담(서경대 공공 4):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방영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여 국민들의 의식형성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3 포 세대'나 '5 포 세대'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를 사용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결혼을 미루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까닭에 국민들의 의식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서경대 경영 3): 저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여성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의 경우 막중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으로 일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낼 경우나, 복직할 경우 거부당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이나 복직을 거부한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뿐만 아닌,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이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아이를 갖게 되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소담(서경대 공공 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과 저출산 문제 극복의 기본이 되는 '결혼'을 중심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한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의식'적인 부분과 '제도 및 구조'적인 부분으로 나뉘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의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디어를 통한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개선'과 '공인들이 앞장선 간소화 결혼식의 확대를 통한 의식개선', 그리고 '언론의 따뜻하고 행복한 방송을 통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분위기 형성'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랑수업의 실시와 그들에 대한 신혼부부주택자금 지원'과 '직장에서의 여성 처우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결혼을 회피하려 하는 한국사회에서, 오늘 토론한 모든 것들은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과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나아가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참고〉
그림 1: 조선비즈

⑫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정우재(한양대 파이낸스경영 3) : 지금부터 한양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혼 비율 또한 줄어들 뿐 아니라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결혼문화와 가사 노동에 있어서의 여성의 편중,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현실, 노후 대비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가족 체계를 형성, 유지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토론에서는 '국가유지의 기본 단위인 가족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가족 문화를 지속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가족 체계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시키는 방안은 자녀 세대의 이른 독립을 관습화하는 것입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단어가 회자되는데, 이는 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지는 세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부모 세대는 은퇴 후 자신들의 노후 생활을 대비하지 못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세대들이 이른 독립을 해야 합니다. 비록 외국의 경우와 같이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반드시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 세대도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되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가족 체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강민우(한양대 경영 2) : 먼저 자녀 세대의 이른 독립을 통해 가족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신선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효과와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의문이 듭니다.

정우재(한양대 파이낸스경영 3) : 저는 당장의 실질적인 효과보다도 그러한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국 사회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른 독립은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키우고 타인에 대한 뿌리 깊은 의존성을 없애는 일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가족 체계는 단순히 생활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른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모두가 획일화된 길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운동, 음악, 미술 등 예체능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은 학생 등 자신의 길을 걸음으로써 쓸데없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정(한양대 철학 4) :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한 여성의 출산과 결혼 기피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의 소비 트렌드와 더불어 사회적 남녀 평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맞벌이가 하나의 선택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 여성이 육아와 일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이는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특수 제도가 아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문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우(한양대 경영 2) :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유리천장'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 생활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꼭 육아 휴가나 육아 휴직 같은 것이 여성에게만 주여져서도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육아는 '여성의 몫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체계가 되어 육아 휴가와 휴직도 공평하게 모든 부부에게 주어지는 식으로 직업의 장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재(한양대 파이낸스경영 3) : 가사 노동 역시 그 사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맞벌이는 필수적인 형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청소, 요리, 빨래, 아이 돌봄과 같은 집안 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지만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사 노동의 공평한 분담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정(한양대 철학 4) :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결혼과 출산 때문에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사회에서 싱글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혜택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싱글들이 더 많은 혜택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골드미스들의 증가입니다. 결혼을 하여 출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사회, 아이를 기르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사회에서 가족을 꾸리는 것보다는 커리어를 쌓아 명예와 부를 획득하고 여가와 취미를 즐기는 등 자신의 삶을 우선하여 돌보는 것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족 공동체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육아 휴가가 넉넉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경우, 다시 말해 가족 체계를 구성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싱글의 경우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부터는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책임지거나 세금공제를 통한 방식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강민우(한양대 경영 2) : 딩크(DINK) 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Double Income No Kids 의 줄임말로,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고 두 배를 소득을 거둬들인 다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이들이 다른 자식을 가진 부부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의 여성에 대한 관점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일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애초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 부터 여성을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사기업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도록 권고 내지는 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재(한양대 파이낸스경영 3) : 오늘 토론에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가족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가정, 기업, 국가적 차원에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 세대의 이른 독립, 남녀 간 평등한 제도 실행과 가사 분담, 출산 및 육아 휴가의 의무화, 기업의 여성에 대한 인식 제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정부 지원의 차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진화 과제 20: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

(제 79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강명재(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언론사가 존재한다.

올해 상반기 언론계 , 특히 방송계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 많은 방송사에서 장기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큰 내홍을 겪은 바 있습니다 . 합의점을 서로 찾지 못하는 기간이 점차 장기화되면서 곧 방송까지 불안정해지고 방송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

장기 파업뿐 아니라 시기 , 구조적 측면에서도 언론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바로 SNS 의 출현 때문이죠 . 시공간을 초월하는 막강한 전파력을 무기로 언론의 보도역할을 점차 SNS 가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언론의 존재 조건은 사람들의 신뢰일 것입니다 . 자본과 수입을 떠나서라도 일단 그 매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그 언론사는 유지될 수 없겠지요 . 구조적인 흐름과 더불어 최근에 일어난 장기파업사태로 현재 한국언론사의 신뢰도는 현저히 추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

언론보도는 객관적인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 사실 (fact) 에서 비롯된 보도라 할지라도 이것이 진실 (truth) 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 마치 이것은 같은 나무로 종이를 만들지 탁자를 만들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 같은 재료로 얼마든지 다른 산출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

그래서 보도에서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청자들이 방송사를 보는 시선도 이 공정성에서 결정됩니다 . 사실에서 시작했지만 불공정한 보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

요즘의 시청자와 독자의 수준은 예전 같지 않아서 편향적인 보도는 금세 눈치채 버리죠 . 결국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문화나 예술 , 스포츠와 같은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생활영역에서 90 년대 중반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는 데 아주 큰 일조를 한 바 있지요 .

사회 , 생활영역에서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리더역할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언론을 보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

사회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민감한 정치적 ,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자세를 버리고 편향적인 태도로 보도하는 경우가 아직도 허다합니다 .

미국의 사례이지만 갤럽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때 ' 신문 중의 신문 ' 으로 평가 받던 뉴욕타임스의 신뢰지수는 49% 로 점차 하락세를 이어가고 , 폭스뉴스 역시 49% 대의 신뢰도를 보였는데요 .



언론은 중립적 태도와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두 신문의 공통점은 바로 진보와 보수의 정점에 있는 신문사라는 것입니다 . 그만큼 이념적 색채가 뚜렷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를 잘 믿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요 . 우리나라에서 소위 메이저 (major) 라고 볼 수 있는 방송 , 신문사 모두 보수적인 성향을 띱니다 .

각 언론사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 다양한 입장 차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것이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한 과정을 거쳐 보도된 기사라는 점에 언론사 스스로가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 공정성을 침해하는 정도의 편파적 보도는 결국 제살 깎아먹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

저는 한 달여 전 , 흥미로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 KBS 에서 KBS 9 뉴스에 나갈 시청자 리포터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 기사를 본 지 일주일 후 9 시 뉴스에서 다섯 명의 시청자가 직접 취재한 아이템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기자들만이 리포팅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과감히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사는 보도의 공정성을 잃지 않는 동시에 ,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 요즘은 SNS 로 인해 개개인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

SNS 발달이 언론의 입지를 좁히게 할 수 있지만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오히려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으로써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청과 소통의 중요성

어렵고 , 권위적이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좀 더 친근하고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애정 어린 시선으로 언론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 대기업의 광고 카피 중 , ' 신뢰 ' 에 대한 유명한 문구가 있지요 . **'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사람들은 신문과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정리합니다 .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언론은 깊숙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

사람들을 응집시킬 수도 , 혹은 갈등을 조장해 분열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닌 언론 . 우리 생활 속에 깊숙히 자리한 만큼 , 더욱 공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보도로 언론의 공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② 김영재(삼육대학교 경영학과)



미디어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가 다양한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미디어기술의 발달로 우리 주변엔 방송 , 신문뿐만 아니라 포털 ,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들이 생겨났고 저마다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국민들은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지만 그에 반해 국민들의 선진의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언론의 기능과 역할도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과거 언론의 역할이 의제를 선정하고 사회적 계몽의 선도였다면 이제는 근거와 배경설명 없이 떠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독자들에게 필요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를 매개하고 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언론이 현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국민들의 의식도 한층 발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경쟁이 과열된 시장 속에서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 이익만을 쫓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

독자들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홍보성 기사와 선정적 보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혹시 여러분은 카파이즘 [Capaism]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이는 전설적인 종군기자 로버트 카파의 이름에서 따온 말인데 한마디로 기자정신을 뜻합니다 . 그는 전쟁터를 누비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

전쟁이나 재난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기자정신이란 보통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추구하고 , 시비를 명백히 하는 비판정신과 책임감 정도로 말 할 수 있습니다 .

기자정신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기자 , 언론 스스로의 자존감과 가치를 높여 언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상업화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자정신을 쉽게 느낄 수 없습니다 . 앞서 말했던 상업화된 언론들의 선정적이며 무의미한 기사들의 생산은 곧 저널리즘을 망치고 기자정신을 비웃는 언론문화를 조장하며 양심과 신념을 지키던 기자들을 주눅들게 합니다 .

그 결과 우리는 좋은 기자를 잃고 , 좋은 언론을 잃으며 앞으로 더욱 질 낮은 기사들만 접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 또한 시민들이 더 좋은 기사를 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만한 공간 또한 없어져 시민의식은 되려 퇴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

기사다운 기사를 찾아 보기 힘든 요즘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인 수준입니다 . 하지만 지금 오히려 기자정신을 바탕으로 한 정도를 추구하는 언론이 두각을 드러낸다면 그 언론은 보기 드문 양질의 언론으로서 오히려 다른 저질 언론들보다 더 선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지혜로운 안목도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언론이 국민 계몽이 아닌 정보 매개의 역할을 하는 지금 언론의 정보를 곧이 곧대로 믿는 것 보단 국민 스스로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며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

기자정신을 기본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기자들과 언론들 , 그리고 그 정보를 소비하는 지혜로운 국민들 . 이 두 가지 요소가 맞물린다면 언론의 발전과 시민의식의 발전 ,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

③ 김우갑(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언론사는 우리나라의 공익을 책임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언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의 제공,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 세 가지 외에도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견인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적 성격을 가진 공중파 방송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의 싹을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싹 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KBS 의 '러브 인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문화 가정도 한국인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 더 개방적이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SBS, KBS, MBC 등의 공중파 방송들이 선진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홍보할 시민 의식이 많은데도 다문화에 너무 집중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 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는 정직, 배려, 준법, 감사 정신 함양 등이 있는데요.



시청률에 얽매이는 언론사들

이렇게 다문화에 집중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원인이 시청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옆집에 외국인이 살 만큼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 다문화는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방송사는 시청률이 높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물론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방송사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청률에 발목을 잡힐 경우 공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중파 방송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청률이 공익 방송의 걸림돌인 것이죠.

따라서 공중파 방송사들이 시청률이나 제작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다문화 외에도 여러 시민 의식의 선진화를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공익적인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는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 14 조에 따르면, MBC 의 이익 잉여금으로 조성된 방송문화진흥자금은 공익방송, 방송영상산업 지원 등에 쓰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2 년의 방송문화진흥자금은 833 억 원이었고, 자금 운영 수입은 54 억 원인데 반해 2012 년의 정책지원 및 방송진흥사업 비용은 52 억 1055 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이 그 질타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방송문화진흥회가 공익 방송 지원에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방송사들은 시청률과 광고 수익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 시스템의 정상화와 공익성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시상하고, 장려금을 주는 등의 제도가 구축되어야 함은 물론 수신료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들이 시민 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자들이나 언론인들의 시민 의식 함양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사 상식이나 논리력,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 언론인의 윤리는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언론사 입사시에 윤리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논술과 면접인데 여기에서도 윤리성을 크게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지칭하는 언론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경향 신문의 기자 윤리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압력 배격, 엄정한 객관성 유지, 보도대상의 사생활 보도, 오보에 대한 신속한 정정, 갈등과 차별 조장 금지 등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각 언론사마다 그 강령이 다르고, 시청률을 생각하다 보면 언론 윤리 강령은 후 순위로 물러나게 됩니다. 언론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대표적 사례가 채동욱 검찰 총장 혼외 자식 사건입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시민 의식 고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언론윤리 강령에는 사생활 보호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사회적인 일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검찰 총장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공익 목적보다도 시청률이나 구독률 등 독자의 관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현재 강제성이 없고 지키지 않아도 제약을 받지 않는 언론 윤리 강령을 지키지 않으면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강제성을 띠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사 입사시에 윤리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강화하고, 입사 후 언론인들이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내에서 정기적인 시민 의식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의식을 갖춘 자들이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에 한해서 방송 제작자들에게 일정 기간을 주고 시청률에 제약을 받지 않고 공익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선진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공익성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청률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론이 공익성 있는 제 역할을 다해야만 우리 나라의 언론은 더 발전하고, 언론의 시민 의식 고취 노력이 국민들에게 잘 흘러 들어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④ 김재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과)



몇몇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거짓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이제는 일상이 되었구요. 이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책임지는 언론 또한 자주 거짓보도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은 정직한 한국을 만들 수 없을까요?

이처럼 정직하지 않은 언론에 대한 불신은 2010 년 일어난 천안함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국일보 26 일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25%가 천안함 조사결과를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응답도 5%였고, 안보상의 문제를 고려해보면 불신비율은 30%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그 누구도 믿기 힘든 상황은 더러 있었습니다. 'NLL 거짓말', '이석기 거짓말', '국정원 거짓말' 등 언론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뉴데일리에서는 흥미로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추방합시다'라는 모토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인보길 '뉴데일리' 사장은 이것이 진실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언론의 사명이자 자유언론의 살 길이라며 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있는 활동입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언론에게 정직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언론이 정직한 시민의식을 퍼트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간 행해지지 못했던 활동이죠. 그렇다면 '정직'이라는 시민의식을 위해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먼저, 언론 스스로 정직해져야 합니다. 이는 언론의 객관적 보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언론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자나 언론사의 의견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중에 거짓이 개입돼서는 안됩니다.

언론이 정직하다면 그러한 결과는 곧바로 돌아올 것 입니다. 최근 정직을 모토로 성공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바로 맥도널드의 사례인데요. 프랑스에서 맥도널드의 패스트푸드가 비만을 일으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맥도널드 측은 이를 인정하고 그 영향을 정확히 밝히며 '일주일에 한 번만 오세요'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매출은 증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똑똑해진 소비자들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정직함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일반기업도 정직을 내세우고 있는 이런 시점에 언론이 정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몰아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자 한다면 이는 더욱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정직해진다면 이어 언론은 정직을 퍼트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몽의 역할을 합니다. 이에 대해 몇몇은 부인하지만, 언론이 주는 정보를 토대로 개인이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계몽적 역할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선진시민의식을 위해 계몽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이에 있어서 정직은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의식이기에 이를 시행하는 것의 의미는 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은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예능이나 드라마 등 흥미로운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첫 번째, 예능이나 드라마와 같은 일반대중에게 흥미로운 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방송했던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여주인공이 계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라고 하여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능이나 드라마를 통해 '정직'을 홍보한다면 그 효과는 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양심냉장고'라는 예능을 통해 이미 실현된 바 있는데요. 이 외에도 언론은 '정직'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한 방법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이슈를 가져와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대중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보기보다는 스포츠나 연예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늘 같은 내용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늘 비리와 부패 이야기, 경제는 늘 불황이고, 사회는 늘 엽기적인 사건들뿐이니 이보다는 신선하고 새로운 연예인들의 이야기나 스포츠에 일반적인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진시민의식인 '정직'의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다 신선한 방식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언론사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계정을 통해 많은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통해 제보를 받기도 하죠. 이처럼 SNS 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정직을 전파해야 합니다.

실제로 조선일보의 '쓰레기를 줄입시다', '자전거사례' 등과 같이 언론의 캠페인들은 실제로 성공적인 수확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에 비해 정직은 보다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만큼 그 효과를 더욱 기대해봅니다.

⑤ 김혜인(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 시민 의식 정착이 필수입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직 • 배려 • 준법 정신 등을 기조로 한 선진 시민 의식의 함양이 필수적이라는 명제에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선진 시민 의식의 싹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의 책임은 "알 권리"에 입각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사회의 공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영역에도 존재합니다. 이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입각한 언론 윤리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언론은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언론 역시 자국의 선진화라는 공익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의 정착을 유도하는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떻게 시민 의식의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이광재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의 역할에는 시대적 흐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후진국의 경우에는 계몽을, 중진국은 사회 • 경제적 발전을, 선진국은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미 후진국의 시기를 거친 우리 나라의 경우 계몽이라는 방식으로 선진 시민 의식을 전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현재 한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계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중의 하나로써 존중받아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칼럼니스트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계몽주의에는 거부감이 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지한 후 시민 의식의 선진화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수용자를 무리하게 계몽하지 않으면서도 선진 시민 의식을 전파하고 있는 언론의 좋은 사례로는 현재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 가〉 와 〈무한도전〉을 들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빠 어디 가〉 의 기획 의도는 현대 사회에서 잊혀져 가는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김과 더불어 아이들의 순수함을 느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정직과 배려 등을 기조로 하는 선진 시민 의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웃음을 위한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이나 출연자들의 올바른 사고 방식 등을 보여줌으로써 선진 시민 의식을 수용자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 방영 이후 캠핑 붐이 이는 등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졌으며 출연자들의 정직한 행동과 배려심을 보면서 본인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언급도 많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무한도전〉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도전은 프로그램 상에서 다양한 공공 캠페인을 보여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환경 보호나 봉사 활동을 주제로 한 특집들을 비롯하여 멤버들의 수많은 기부 내역은 선진 시민 의식의 정착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한도전〉 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들을 계몽하려 하지 않습니다. 김태호 무한도전 PD 는 ‘아침밥을 먹읍시다!’ 처럼 예능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를 계몽하려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근본은 시청자와의 공감이므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그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의 형태로 풀어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선진 시민 의식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수용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므로 호감도도 높을 뿐더러 그 파급력도 큽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두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수용자들을 계몽하려 시도하는 것보다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성숙한 시민 의식의 정착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공익을 위한 우리 언론의 역할”에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성숙한 시민 의식이라는 메시지를 공감대 형성이라는 방식으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한다면 선진 시민 의식을 거부감 없이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론은 기존의 뉴스 보도 등과 더불어 이러한 방식으로도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언론은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언론이 국민들에게 선진 시민 의식의 단초를 제공하되, 강요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여 선진화를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선진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⑥ 백주아(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진실을 향한 고독한 투쟁의 길을 보여주는 외국의 언론사례

1972 년 6 월 17 일,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5 명의 괴한이 침입합니다. 이들이 체포되면서 시작된 사건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공화당 출신의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노리는 조직원들이 민주당 사무실에 잠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었죠.

처음에 괴한들의 체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절도 사건 정도로만 치부했었습니다. 해프닝 정도로 넘어갔을 사건이 어쩌다 이 미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요?

그 바탕엔 투철한 기자정신으로 무장한 풋내기 기자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워싱턴 포스트 사회부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입니다. 두 기자는 국민의 무관심을 감내하고 닉슨 측근의 생명 위협을 무릅쓰며 진실을 향한 고독한 투쟁의 길을 걸었습니다.

두 기자는 끈질기게 사건을 파헤치면서 닉슨 정권의 선거 방해, 정치 헌금의 부정과 탈세를 밝혀냈고 결국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험한 길을 걸으며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감내하고 그들은 거대권력을 굴복시켜 정의라는 진실을 얻어냈습니다.

당시 언론들과 그들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했을까요? 다른 언론들은 백악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fact)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사건을 상황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려진 진실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 감춰진 진실을 발굴하는 기자정신으로 탐사보도의 대가로 우뚝 선 두 기자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부정비리의 고발을 주요한 책무로 삼는 기자에겐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는 말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상기하면 요즘 우리 언론의 안타까운 모습에 한숨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그저 있는 사실, 누구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아낼 수 있는 그 사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식에 그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고, 무엇이 어떻게, 왜 사건이 발생한 것인가. 육하원칙만 충실히 지켰다고 이를 과연 좋은 보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언론인들이 사건에 대한 진실, 즉 어떤 정보가 신뢰할 만한가를 증명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안정된 관점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론에게 바라는 건 단순한 사실이 아닌 정교한 진실인 것이죠.



언론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물론 뉴스가 사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성만을 토대로 구축된 저널리즘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즉 이제는 사실을 성실하게 보도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론인은 자신들이 앵무새처럼 뉴스를 전해주는 대변인이 아니라 의의를 만들어 내는 사람(sense maker)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인의 몫은 '사실'로 위장한 소문이나 빈정거림, 편견들을 추려내고 그에 관한 '진실'에 집중하여 이를 검증해내는 일입니다.

기자들은 일단 사실들을 검증한 뒤, 그 시점에서 무엇보다 타당하고 앞으로 더욱 치밀하게 조사해야 할 그 의미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칼 번스타인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진실"을 제공하기 위한 기자의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진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언론인은 이제 단순한 사실 그 자체를 초월해 맥락과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진실을 좇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관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언론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널리즘의 의무는 첫째도 둘째도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를 밝혀주며, 중요하지 않을 것을 걸러내도록 해주는 역할을 다해내기 위해서 언론은 이제 변해야 합니다.

미국 NBC 간판 앵커 톰 브로커는 "저널리즘이란 그 날의 열정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언론이 어떠한 현장에서도 한 치의 거리낌없이 오직 진실만을 좇기 위해 자신들의 열정을 충분히 발휘하는 진실된 언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⑦ 손계준(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규모 세계 10 위권 대, 국민 총 생산도 2 만 달러를 넘은 지 오래되었지만 국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아직도 하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한 걸까요? 진정한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발돋움하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입니다. 즉, 문화적인 선진화가 있지 않고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인식에 후진국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와도 사람이 없고 차량 통행만 없으면 대부분 그냥 통과하는 것이 흔한 광경이고 각종 오수, 폐수 및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자연을 오염시키고 주변지역을 황폐하게 만드는 등의 사회문제는 너무나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 소유주의 경영장악과 더불어 '광고주'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수입 중 광고료의 비중이 커지면서 내용의 차이가 없는 비슷비슷한 신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지면에는 광고만 가득한 경우가 많은데요, 재정자립도의 부재로 인해 언론은 제 역할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일 뉴스와 신문에는 불량 먹거리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그 수법은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대중들은 이러한 이슈를 주로 언론을 통해 접하고 언론을 이용해 반응하는데요,

그럼 언론은 이러한 사회적 병폐들을 단순히 취재하고 고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한정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21 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뉴미디어인 인터넷기반 SNS 의 영향도 거대해져, 언론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숙한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디지털 시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은 바로 주변 환경을 감시하고 사회 여러 세력들의 통합을 촉진하며 사회구성원에게 새로운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선진화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에서도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언론의 역할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피드 백'이라고 합니다. 1990 년대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미래사회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창출하고 싱가포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언론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화할 것인가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1 세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충돌하는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재조직하는 움직임은 매우 큰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정부주도로 정보매체로의 통합을 기획하고 이전에 '감시와 검열'의 수단으로 작용했던 언론을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로 변화를 꾀했는데요, 이를 통해 훨씬 신속하게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언론이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언론은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현재 시민의식의 선진화 과정에서 언론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과 금권 등의 압력에서 자유롭기 힘들고, 인터넷매체의 등장으로 기존 언론들의 수익성이 '시청자의 흥미'를 끌지 않고서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지속적으로 '권력'과 멀어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사에 어떠한 뉴스가치를 담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이 선택한 뉴스에 대한 안목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극적인 내용 위주로 짜깁기를 하여 설명력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독자나 네티즌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언론이 처해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 가지 대안으로 정부기관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촉진시키고 그들이 권력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일종의 펀드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자립이야 말로 사회가 요구하는 언론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저널리즘이 좋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언론계에 퍼져야 할 텐데요,

이렇게 구조적 독립을 이룬 다음에는,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이 제휴를 맺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적 움직임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언론이 그 중심에서 사회가치 지향적인 기사들을 생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⑧ 송현지(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최근 많은 시민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 대신 촬영에 열중합니다.

여러분, SNS 가 시민의식을 망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버스에 불이 났을지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신고는커녕 몰려들어 사고 차량의 사진만 찍고 있다던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는 전혀 개의치 않고 타인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를 SNS 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나르고 신상 털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최근 한국의 SNS 사용자가 2 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시민의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 는 이를 통해 거짓 정보나 오정보가 퍼질 우려가 높고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나 에티켓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SNS 의 언론 기능에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SNS 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섭도록 커지는 현 상황에서 기존 언론매체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언론매체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그들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익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언론이 선진화된 시민의식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사회 변화에 따라 언론은 시민의식 선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실천해가는 국민적 운동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론은 사회 공익을 추구할 의무를 갖습니다. 수많은 국민적 과제와 사회적 현안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이 시민의식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점진적으로 인내를 갖고 변화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대 언론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 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표출시키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론의 장 형성을 촉진하는 촉매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캠페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진시민의식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준법, 정직, 배려 등의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과 그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언론이 길을 열고 앞장서야 합니다.

이러한 언론의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한 예로 '휴마트 인성교육캠페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인성교육을 위해 2013 년 3 월부터 언론, 국회, 정부, 지자체, 기업, 재단 등 사회 각 기관들이 한데 뭉쳐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휴마트는 2013 년 중앙일보가 제시한 21 세기 어젠다로 인간성(humanity)과 스마트(smart)의 합성어입니다. 그 동안 개별 기관의 인성교육 실천 사례는 있었지만 언론이 정,관계와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나선 사회 공헌은 이 캠페인이 처음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국내 최초의 인성학교인 '휴마트 인성스쿨'이 지난 7 월 11 일 문을 열었는데요, 휴마트 인성스쿨에서는 초,중학생들이 2 박 3 일 동안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감사, 배려, 봉사, 협동 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그 동안 구체적 실천이 부족했다면서 언론이 사회적 어젠다를 제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힘을 합쳐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 언론이 시민의식의 성숙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감사운동 캠페인 (출처:한국선진화포럼)

저는 현재 다양한 사회 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시민의식 함양 캠페인들을 언론과 함께 진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늘 접하는 미디어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민의식 성숙의 중요성과 방법을 전달할 수 있다면 비용도 절감하고 효과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사나 신문과 같은 기존 언론들은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 세대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 매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도기에 있는 현재 SNS 의 언론 기능이 자리잡기까지 기존의 언론매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언론은 사회의 공익을 위해 혁신을 꿈꾸고 변모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SNS 가 널리 보급된 현 시대에 기존 언론매체는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두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반드시 그 역할을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현 시대의 언론이 선진화된 시민의식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요?

⑨ 이동석(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정치권력과 언론이 공생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얼마 전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논란 끝에 사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혼외아들의 존재 유무와 관련된 실제 사실과는 별개로 정치권력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언론과 정치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언론이 전달한 뉴스의 주요 공급처이고 언론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어필하고 홍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서로의 필요에 의한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생관계가 종속과 지배의 관계로 변할 때입니다. 언론이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순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언론의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순응하게 된다면, 즉, 사회 전체,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지배계급, 기득권층만을 위한 꼭두각시 같은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선진언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위에 말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언급한, 혼외아들 논란으로 인해 사퇴하게 된 채동욱 검찰총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부인하는 혹은 책임을 돌리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과 달리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당연히 채 총장과 청와대, 여당의 관계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혼외 아들 논란에 대한 보도를, 그것도 1 면에 크게 내면서 채 총장 흔들기에 나섭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논란'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사실여부에 관해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혼외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그렇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하지만 아직 '루머'에 불과한 논란을 사실인 것처럼 1 면에 보도한 조선일보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을까라는 의혹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을까라는 의혹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이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선진언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위기에 봉착한 우리나라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찾는 기능이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그 사회는 문제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은 진정한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진정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 즉,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우리 사회의 담론들을 제대로 담아내는 본분을 다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⑩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사회 주요 agenda를 제시하는 주체는 바로 언론입니다.

큰 나라에 큰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숨겨진 의미는 나라 전체를 위한 바른 생각을 구성원들이 제시하여 실현이 되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한 이유도 같은 선상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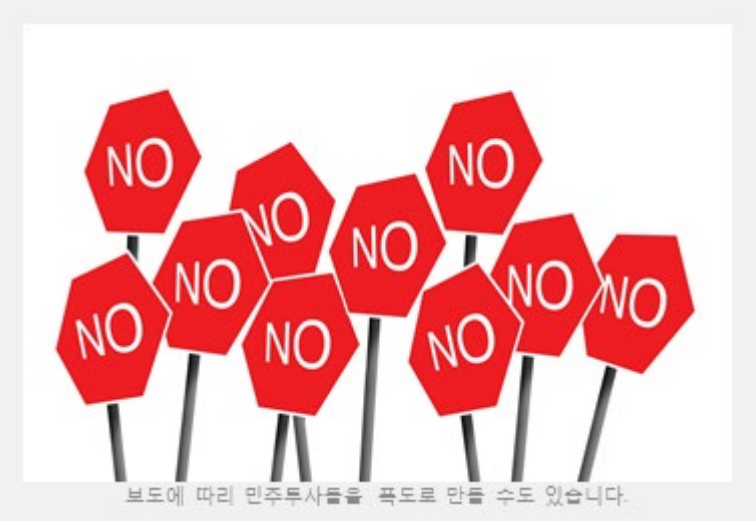
그러면 구성원들이 선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주요 agenda 를 제시하는 주체는 어디일까요? 바로 언론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에 대한 보도가 나가면 이를 모르던 국민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요.

그렇다면 언론이 선진시민 의식을 북돋기 위한 주체로써 어떤 책임 의식들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언론이 단순히 사실보다 진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정 저널리즘'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는지요?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해 한 쪽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이라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5 : 5 로 반영하여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기사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1 년 이집트 혁명을 법정 저널리즘 원칙으로 독재자와 시민의 발언들을 5:5 로 언론들이 보도한다면, 악덕한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교훈적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저널리즘은 사실만 그대로 전달할 뿐이기 때문에 agenda setting 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식을 위한 바람직한 언론의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 제공을 위해서는 특정 사실이 존재하는 맥락을 걷어내지 않아야 독자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보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문제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진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agenda 발안자로서 언론의 두 번째 책임 의식을 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실이 존재하는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의 한 정치인이 연설 중 국민들의 낮은 의식 수준 문제를 지적하는 대목이 의식수준 계몽의 필요성 주장이라는 전후 맥락이 언급 되지 않은 채 보수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야당의 아무개 정치인, 국민들은 저열한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대문 기사가 대서특필되면 그 정치인이 의도했던 계몽의 의도는 가려지기 때문에 이 경우 올바른 agenda setting 은 실패할 것입니다.

덧붙여 언론사의 주된 수익 원천은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주인 대기업, 기득권층 등 사회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보도에 반영되어 사실이 존재하는 맥락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익구조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노출되지 않아 앞에서 언급한 언론의 책임 구현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는 공영방송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제시한 agenda 들을 통해 선진 시민의식을 구현하고 나아가 선진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는 결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 또한 숙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언론들이 던진 다양한 agenda 들이 선진사회 구현에 있어서 필요한 의제들인지 선별적으로 판별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⑪ 이효정(서울대학교 불어교육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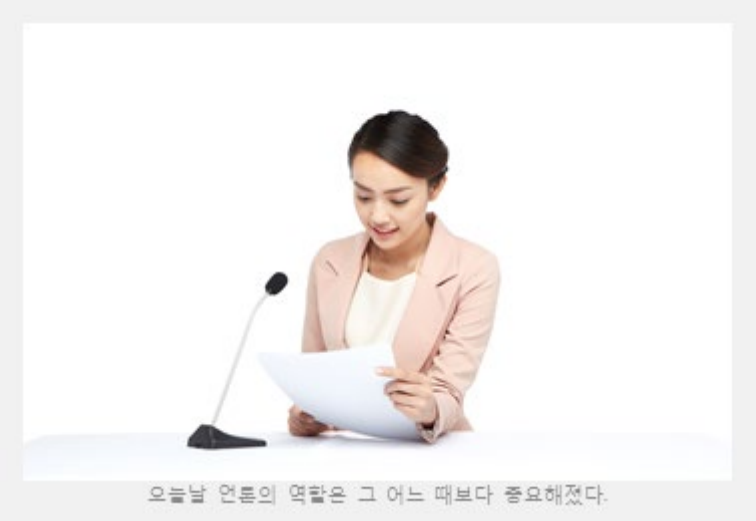


막 검정 절차를 마치고 사회에 공개된 역사교과서를 놓고 우리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서 논란이 되는 출판사의 교과서를 옹호하는 기사를 싣는 반면 다른 언론사에서는 ‘역사 쿠데타’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사들마다 성향에 따라서 진보나 보수를 표방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의 옹호’라는 것을 상기해 보면 편을 갈라 싸우는 현대 언론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비단 어떤 현안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보도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 월에 교총과 전교조 교사들이 함께 백혈병 아이들을 도왔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상당수의 언론매체들이 그 제목을 이례적인 일이라는 식으로 지정하여 이미 편을 가르는 것을 내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민족은 일제의 침략 하에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항쟁을 벌였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와 평등을 수호하는 공화국을 세웠으며, 민주화를 이끌어 낸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들의 태도는 사사건건 마치 대한민국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오늘날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선진시민의식이 있는 사회를 이룩해 나가고자 하는 지금,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정책의 홍보나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전달하고 일부 사회 운동을 주도하는 과거의 역할에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언론사가 모두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유입되기에 언론은 사회 계층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준에는 누구나 보편 타당하게 동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론사들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가령, 적어도 역사를 바르게 보고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핵심적 가치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듯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동행하고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가 공감해 온 관습적 가치들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시민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핵심적 가치와 기준의 정립 하에 언론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때 일반 시민들에게 건전한 상식과 판단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선진화에 비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 아베 총리는 '침략'은 국가마다 그 정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며 일제 강점기에 대한 사과를 회피하려 하고, 일본의 정치인들은 전쟁 범죄자들을 일본 내의 문제라며 덮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같은 국민들끼리 편을 갈라서 지나친 의견 대립을 보인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설정 해 두고, 보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언론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⑫ 임성현(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공정한 언론을 위해 언론인들의 노력은 끝이 없다.

작년 2 월부터 7 월까지 MBC 는 노조파업에 들어갔고 그 결과 MBC 사장이였던 김재철 사장은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MBC 뿐만 아니라 KBS, YTN 등도 파업에 동참했는데 그 이유는 정권에 편파적인 보도를 지시하는 상부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MBC 와 같은 언론사들이 파업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언론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신 분들도 있고 노조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했다고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론의 공정성'이 파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언론은 얼마나 공정할까요? 매년 미국의 비영리 단체 Freedom house 에서는 세계 언론들의 자유도를 측정해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란, 단순히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Freedom house 에서는 세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법적 환경, 둘째로 정치적 환경, 마지막으로 경제적 환경입니다. 이러한 척도에서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 순위는 세계에서 50 위, 높은 순위인 것 같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순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순위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고 남유럽 국가나 일본 또한 높은 순위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다른 경제, 정치적 지수처럼 언론 자유도 또한 상위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유도 순위가 이토록 낮은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언론 탄압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MBC 의 경우 파업하기 직전 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로지 정부가 잘한 점만을 보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 스스로도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보다는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를 함으로서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성보다는 국민들의 이목만을 끌려하고 있는 현재 언론의 모습은 국민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능력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알자지라 방송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중동방송 '알자지라'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하면 독재와 탄압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쉬운데, 어떻게 알자지라 방송국은 이러한 중동 국가에서 공정한 방송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알자지라 방송국은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알카에다를 상대로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랍세계의 대변자를 자청하며 객관적인 보도 태도로 명성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알자지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알자지라에서 내세운 취재윤리 10 가지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 가지의 내용에서 공정성, 정직성, 투명성 등 언론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제시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언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자지라 방송이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11 년 9 월에 편파적인 보도를 낸 보도본부장의 사퇴를 볼 때 적어도 공정하지 못한 기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한 언론은 어쩌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나 공정한 사회가 없듯이 언론도 완벽하게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언론은 공정해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언론인들이 이를 망각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처럼 우리 언론도 그들의 본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도를 한다면 공정한 언론, 가능하지 않을까요?

⑬ 김광래(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우리나라는 국토의 크기는 작지만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통신 분야로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앨빈 토플러가 말했던 제 3 의 물결, 정보 통신이 발달한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선진국 대열에 든 것이다.

이런 정보가 넘쳐흐르는 현 정보화 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NLL 사태와 국정원 사태를 비롯해서 언론의 거짓된 행보는 권력 앞에 작아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

특히, 지난 6 월부터 4 개월 간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촛불집회가 있었지만,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다. 또한 선거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지금까지도 정권에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해오고 있다.

이들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를 악의적으로 누락·축소·은폐·물타기 보도하는 데 혈안돼 있다. 언론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정권의 호위대, 민주주의 파괴자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지난해 12 월 국정원 직원이 선거와 관련한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된 순간부터, 경찰의 거짓 중간발표, 경찰의 눈치보기 수사 결론, 검찰의 수사와 외압논란이 일어났던 주요 시점마다 조중동과 공영방송에서 국정원을 비판하는 보도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이들은 오히려 검찰수사를 흔들며 '국정원 비호'에 나섰다.



사실을 규명하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보도자체를 내지 않거나 단신 혹은 후반배치해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또,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해 '민주당 매관 의혹', '여직원 감금'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NLL 포기발언 논란'을 부각하며 물타기에 나섰다.

심지어 MBC 는 시청자에게 예고까지 했던 〈시사매거진 2580-'국정원에 무슨 일이?〉를 끝내 불방시켰고, 국정원 직원이 YTN 기자에게 압박 전화를 걸어 결국 선거 개입을 증명하는 특종보도를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들 언론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를 '방관'한 것을 넘어,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보도를 통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덮는 '공범'이다.

이처럼 언론은 문화 전도, 오락 제공 등의 기능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객관적이며 정확한 사실 보도와 사회 현상 감시, 대중을 계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요즈음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보도자료들이 많이 보여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 보도, 관점 제시 보다는 광고성 기사, 오락성을 위한 단순 연예 관련 기사, 등이 수많은 포털 사이트를 장악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대중들은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그런 수요에 맞추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클릭 수'를 유도하기 위한 기사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 앞에 공정한 미디어매체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해결하기 결코 쉽지 않다. 미디어의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 보도매체의 임원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현 시대 강력한 정보매체가 생겼는데 바로 스마트폰 과 각종 SNS 이다. 이는 곧 우리 스스로 공정한 매체를 만들 수 있다. 스스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내세워 수정하고, 비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SNS를 통해 우리 스스로 정당한 매체를 만들고 비판 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노력과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언론사도 선진화를 이끌 수 있다.

⑭ 김민정(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바야흐로 2013년은 SNS의 시대이다.

바야흐로 2013 년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시대입니다. 21 세기 최고의 혁신이라 여겨지며, 스마트폰의 전파와 함께 더 막강한 실시간 전파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SNS 는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과 빠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 이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20 대 인터넷 이용자 10 명 중 9 명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스마트폰 이용자의 87%는 스마트폰을 통해 SNS 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SNS 관련 심의 현황'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경우는 2009 년 1 건이었던 것이 2010 년 39 건, 2011 년 184 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불법정보 유포로 적발된 건수는 2009 년 54 건에서 2010 년 345 건, 2011 년 780 건으로 2 년 새 15 배 늘었습니다. SNS 에서 비롯된 개인 사생활과 인권 피해 사례만 1 만 6698 건에 달하며 SNS 의 확산속도와 함께 피해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SNS 의 피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악플과 같은 모욕 내지 언어폭력,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실제로 SNS 의 자극적인 글들은 실시간으로 확산됩니다.

SNS 특유의 개방형 정보는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악플과 같은 모욕적인 언어폭력과, 마녀사냥처럼 개인의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SNS 의 부작용이 나타면서 'SNS 피로감'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생활이 원치 않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SNS 를 그만두려 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과 과시'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피로감을 더 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대학 내일 20 대 연구소'가 대학생 835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SNS 사용을 그만두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6%가 '자주 해 봤다'고 응답하였고, '한두 번 정도 생각해봤다'는 사람도 52%에 달했습니다.

또한 SNS 는 각종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올리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SNS 의 특성으로 아직 성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도 음란물과 폭력물에 여과 없이 노출됩니다.



광주에서 초중등생이 SNS범죄를 저지름

최근에는 연예인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공유하고, 이를 유포한 초중등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SNS 를 이용하여 합성사진이나 음란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SNS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미디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SNS 의 부작용은 늘어나고 있고, SNS 을 활용하는 범죄행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정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여러 가지 범죄행위에도 노출됩니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SNS 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시대를 살 수 없습니다. SNS 의 순기능을 잘 살리면서 SNS 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디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해진 현재, 가장 인성교육이 필요한 곳은 365 일 24 시간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미디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디어 인성교육만이 SNS 의 부작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SNS 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건전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수의 판단력에 휩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의사표현을 통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문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인성교육'을 강화시켜 정보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표현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을 지에 대한 배려를 배운다면 우리의 SNS 문화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SNS 가 급격히 우리 사회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SNS 시장은 막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인성교육'을 확립시켜 SNS 의 장점만을 더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⑮ 김수창(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올해 여러 연예인들의 열애설이 보도되었다.

올해 2013 년은 각종 기사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열애설이 불거진 일이 너무나도 많았던 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을 품을 법한 것이 유독 특정 기간에 집중하여 아이돌을 비롯한 각종 연예인들의 열애설이 불거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100%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고위층이 자신들의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한다는 의혹은 이제 숨기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례로 지난 7 월 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남미녀 배우 원빈 씨와 이나영 씨의 열애 사실이 보도되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또,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예로써 지난 10 월 11 일, 탤런트 방성준 씨와 가수 수지 씨의 데이트 장면이 포착된 기사가 다수 언론사에 의해 보도됨으로써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지만 열애설에 묻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010 년 3 월부터 2013 년 6 월까지 해군 2 함대사령부가 국민들에 의해 모금된 천안함 성금 3 억 1289 만원 중 4 분의 1 을 훌쩍 넘는 7975 만원을 지휘관·참모에 대한 격려금 지급 및 회식비, 함대 기념품 구입 등에 사용한 일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은 본연의 역할을 추구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유력 언론사들은 국민들이 스타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고위층의 비리 대신 스타의 열애설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태껏 한국 언론사는 '진실 추구'를 모티브로 하여 흘러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38 년 전인 1975 년 3 월 18 일에는 동아일보의 130 여 명의 언론인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정권에 투쟁하다 강제 해고를 당하고 나서 동아투위(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설립하여 계속해서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그 누구보다도 권력층에 대해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선진 시민의식 확립을 위해 앞장서야 할 언론이 고위 권력층에 굴종하여 그들의 비리를 덮는 뚜껑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경에까진 이르렀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8 월 1 일에 발표한 '2013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언론자유 지수가 31 점으로 세계 197 개국 가운데 칠레와 이스라엘, 나미비아와 함께 공동 64 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 총생산 세계 15 위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크나큰 장애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올바른 진실 추구를 위하여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첫째, 언론은 고위층에 굴종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보도할 것은 거침없이 보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둘째, 언론은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가의 주인 즉.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기사를 검열하는 과정에 편집국장이나 언론사 경영주 뿐만 아니라 시민 기자단을 파견하여 국민들에게 기사 검열을 부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도 좋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크나큰 책임을 지니고 있는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온전히 수행하는 것 또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 않을까요?

⑯ 김한결(강원대학교 일본학과)



건전한 온라인 언론을 위한 이용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폰과 SNS(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뉴스와 신문에 접촉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양과 넓은 범위의 언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몇 번이나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 년 인터넷뉴스미디어 이용자는 전체 인터넷이용자의 93.82%로 일년의 10 번 이상은 인터넷 뉴스를 이용하였고, 언론사별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뉴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전문으로 뉴스를 취급하는 언론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포털 사이트 혹은 인터넷 신문은 '클릭수의 경쟁'이라고 불리며 더 많은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삿거리로 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포털 사이트의 경우 한눈에 이용자의 시선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기사제목과는 다른 제목을 게재하여 기사를 읽기도 전에 독자에게 편견을 주어 기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10 년 11 월 한 포털 사이트 뉴스 홈의 제목은 '성추행 교장은 경징계, 후원금 낸 교사는 해임'이라는 뉴스가 올라왔지만 실제 기사의 제목은 "성추행 교장은 경징계, 정당 후원금 낸 교사는 해임이라니"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뉴스 홈의 제목만 봐서는 후원금을 낸 교사가 학교에다 후원금을 낸 것 인지, 교장에게 후원금을 준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기사를 클릭하고 나서야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전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일치의 정도가 무려 72%를 웃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인터넷 뉴스에서는 공인에 관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의 기사를 올렸지만 기사의 허위보도로 소송에 휘말려 결국 오보 사과문을 게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높은 조회수로 많은 뉴스 이용자에게 읽힌 뒤였습니다.

온라인 언론의 접촉이 용이할수록 이용자인 우리들은 무엇보다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온라인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언론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인터넷 언론의 발달은 경쟁을 부추기고 그럴 때마다 자극적이고 사실이 아닌 기사를 끊임없이 생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론 정보를 생각 없이 무비판으로 받아들인다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기사는 계속해서 이용자에게 읽혀질 것입니다.

독자가 먼저 양질의 기삿거리를 찾고 받아들여야만 언론사 또한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질의 보도를 생산할 것이며 이러한 경쟁이 이루어져야만 온라인 언론뿐 아니라 TV, 신문을 통해 접하는 언론 모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뉴스를 접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신가요? 기사에서 주어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나요? 혹은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를 생각하시면서 기사를 읽으시나요? 온라인뿐만이 아닌 모든 언론보도를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가 100 점의 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⑰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오늘날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생활이 확대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무차별적인 정보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언론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꾀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아닌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추구하며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언론은 편중된 정보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이끌어가야 할 언론은 국민들에게 공정한 정보가 아닌 편중된 정보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며, 선진시민의식 구축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진시민의식을 훼손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준선진국인 한국은 온전한 선진국으로 가는데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 즉 선진시민의식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발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제 역할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언론, 국민의 언론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의 언론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불신의 아이콘이 된 것은 어쩌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방책일 수도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에 길들여진 이 시대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현실에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지탄을 받는 이유는 급변하는 현실에 사는 국민의 바른 길잡이로서의 역할, 즉 혼란한 사회 속에서 국민들의 중심이 되어 바로 서지 못하고 현실에 동요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급변하는 사회의 트렌드에 발 빠르게 움직여 국민들의 잘못된 시민의식을 일깨워 주는 매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정보에 길들여져 있고 각박한 사회 속에서 정치나 시사와 같은 딱딱한 정보보다는 실소에 그칠지라도 예능에 목매는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선진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요즘 KBS '인간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능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는 현대문명의 이기 속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을 고민해 보자는 것으로, 쓰레기 없이 살기, 책 읽으며 살기 등 바쁜 현대인들에게 참신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예능과 다큐멘터리를 접목시킨 예능다큐인 〈인간의 조건〉은 6 명의 개그맨들의 일상을 통해 소소한 웃음과 함께 그 속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선진시민의식 구축을 위해 그저 딱딱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한 메시지 전달은 국민의 사회통합도, 언론이 제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정보가 아닌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유연성 있는 언론의 모습이 필요한데요.

감성과 소통의 시대라는 트랜드에 맞게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따뜻한 언론의 모습을 통해 국민의 언론으로 자리매김 한다면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진정한 언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⑱ 채　련(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뉴스를 보지 않는다 ?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되어버린 편견이다 .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확산과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의 확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 이에 따라 뉴스를 이용하는 미디어 독자들의 태도 또한 급변하고 있다 .

이제는 뉴스를 앉아서 보는 시대는 가고 있다 . 앉아서 텔레비전과 신문을 보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스마트폰과 테블릿을 이용한 ' 이동형 ' 뉴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특히 스마트폰은 통합 미디어로서의 특징을 가질 뿐만 아니라 , 사용자가 24 시간 내내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미디어 중 접근성이 가장 높다 .

또한 이와 같은 이용 방법의 변화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는데 , 바로 신문기사를 보지 않던 젊은 층의 접근을 이끌어 낸 것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2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 에 따르면 신문기사 이용경로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PC 를 통한 인터넷 ' 으로 , 전체 응답자의 57.4% 였고 , 바로 그 뒤를 이은 것이 ' 스마트폰 ,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 으로 , 이전 해의 2 배이상 증가한 47.4% 였다 .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문기사 이용 비율은 8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신문을 읽지 않는 세대 ' 로 알려진 젊은 층에게 모바일은 신문기사 이용 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준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상황은 ' 인터넷 뉴스 ' 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대다수의 젊은 층이 'pc 를 통한 인터넷 ' 이나 ' 스마트미디어 ' 를 이용해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다 . 따라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터넷 뉴스가 곧 언론을 대변한다 .

연도별 인터넷신문의 등록 현황을 보면 2005 년 3.8% 였던 것에 비해 2012 년에는 27% 로 급증가 했다 .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그 수도 무작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정기간행물	7,536건	8,551건	9,479건	9,652건	12,961건	12,081건	13,268건	14,236건
인터넷신문	286건	626건	927건	1,282건	1,698건	2,484건	3,193건	3,850건
비율	3.8%	7.3%	9.8%	13.3%	13.1%	20.6%	24.1%	27.0%

연도별 인터넷신문등록 현황 (출처: e-나라지표 2012)

그렇다면 이 인터넷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뉴스기사의 주제는 무엇일까 ?

주요 방송사 뉴스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정치와 사회적인 내용이 많았던 반면 , 인터넷 뉴스들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제는 바로 ' 스포츠 • 연예 ' 였다 . 인터넷뉴스를 보는 독자들은 스포츠와 연예에 대한 기사만을 편중되게 보게 될 수밖에 없다 .

구분 1	구분 2		사례수 (건)	뉴스기사 주제(%)									합계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생활 - 문화	스포츠 - 연예	과학 - 의료	남북 - 북핵	기타	
포털 뉴스 서비스	네이버	뉴스박스	1846	15.5	16.1	21.3	10.8	7.0	21.3	6.3	1.4	0.2	100.0
		뉴스섹션	455	16.5	16.9	24.0	9.0	6.6	21.5	4.4	0.2	0.9	100.0
	다음	뉴스박스	467	5.6	19.3	10.9	3.0	6.4	51.2	2.8	0.0	0.9	100.0
		뉴스섹션	262	6.1	16.4	22.5	10.3	5.7	35.5	2.3	0.0	1.1	100.0
	계		3030	13.3	16.8	20.2	9.3	6.8	27.2	5.1	0.9	0.5	100.0
방송사 뉴스 서비스	KBS뉴스		258	19.4	22.9	34.1	16.3	1.2	0.0	1.9	1.6	2.7	100.0
	MBC뉴스		207	21.7	16.4	33.8	16.9	2.9	1.0	6.3	0.0	1.0	100.0
	SBS뉴스		158	25.3	3.8	27.8	20.3	5.1	11.4	1.9	4.4	0.0	100.0
	계		623	21.7	15.9	32.4	17.5	2.7	3.2	3.4	1.8	1.4	100.0
전체			5874	24.4	13.4	24.1	8.8	6.9	17.0	3.6	1.3	0.6	100.0

주1: 구분 1의 검정통계량: $\chi^2 = 1241.99$, d.f. = 24, p=0.000

주2: 구분 2의 검정통계량: $\chi^2 = 2005.01$, d.f. = 112, p=0.000

인터넷 뉴스미디어의 뉴스기사주제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또한 실제로 20-30 대의 인터넷뉴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인터넷 뉴스에 관해서는 접근하지만 내용과 질에 관해서는 의심스럽다 .’ ‘ 뉴스는 인터넷으로 볼 때보다는 편리하게 여러 개 정보를 본다 . 그러나 내용을 보게 되지는 않는다 .’ ‘ 인터넷기사는 질이 떨어지고 , 진정성도 적은 것 같다 .’ ‘ 내용은 별로인 듯 , 깊이가 떨어지고 , 신뢰도는 떨어진다 ,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도 있다 .’ 등의 의견이었다 .

인터넷 뉴스는 그들의 기사에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 자극적이고 낚시성의 기사를 올리지만 막상 내용은 별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 또 기자는 아무나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맞춤법도 틀리고 내용의 논리성도 전혀 없는 질 떨어지는 기사들도 많이 볼 수 있다 .

인터넷 뉴스의 이용과 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 젊은 층의 저널리즘을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현재 인터넷 신문은 자율규제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되어 질 지는 의문이다 .

따라서 무엇보다 인터넷 신문사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 미디어를 통한 저널리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 자신이 쓴 기사가 독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또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신뢰성 있는 뉴스기사를 생산해야 한다 . 결국 뉴스도 양보다는 질이라는 말이다 . 좋은 퀄리티의 기사와 다양한 주제를 새롭게 알려주는 신문사라면 젊은 층도 신뢰하고 즐겨보게 될 것이다 .

또한 , 독자들은 스마트리더 (smart reader) 가 되어야 한다 . 요즘과 같이 범람하는 미디어의 물결 속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고수해야 한다 .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신문사의 기사를 읽어야 하고 , 확인된 사실만을 믿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연예뉴스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 의식적으로 정치와 사회뉴스에도 관심을 기울여보자 .

인터넷뉴스는 우리에게 ‘ 양날의 칼 ’ 이다 . 젊은 층이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볼 수 있게 좋은 접근성을 가져다 줬지만 , 그 만큼 신뢰할 수 없는 뉴스와 정보들에 대한 접근도 높아졌다 .

이러한 문제는 결국 개개인의 의식을 선진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 언론과 독자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굿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⑲ 홍용남(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현재 , 대한민국 언론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등 SNS 가 기존 언론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매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문 , 뉴스 등 기존 언론에 대해 평가절하한다 . 왜 이런일이 벌어진 걸까 ?

어떻게 해야 언론이 바람직해보일까 ?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면 건전한 언론이 될까 ? ' 완전한 사실보도 ' 가 건전한 언론의 필수 사항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만약 , ' 완전한 사실보도 ' 가 보장된다면 신문사가 굳이 여럿 존재할 필요 없어 보인다 . 똑같은 사실에 대한 보도를 여러 신문사가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

언론은 군중의 사랑을 먹고 쑥쑥 자라난다 . 그런데 , 군중이 어디 한 마음 한 가족이던가 ? 개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선호하는 스타일도 다르다 . 하나의 언론은 이러한 군중들의 욕구를 채워 주지 못한다 . 따라서 , 사실 보도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언론은 대립하는 진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 그러는 편이 군중들에게도 이로워 보인다 .

그런데 , 실제로 현재 20 대 30 대 젊은 층들은 뉴스를 보는 시간보다 SNS 를 접하는 시간이 더욱 길다 . 군중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SNS 에는 자극적이고 반 정부적 내용들이 쉽게 공론화 된다 . 친정부적이고 , 현재 세상을 존중하는 내용의 게시글은 화제가 되지 못한다 .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이 그저 흘러가고 있는 일상이 화제가 될 리 없다 .

소설가 공지영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에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 나치 ' 에 까지 비유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 공지영은 자신이 이육사와 같은 드라마틱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걸까 ? 어쨌든 , 공지영은 이 트윗으로 인해 유명세를 탔고 네티즌들의 질타와 사랑을 모두 받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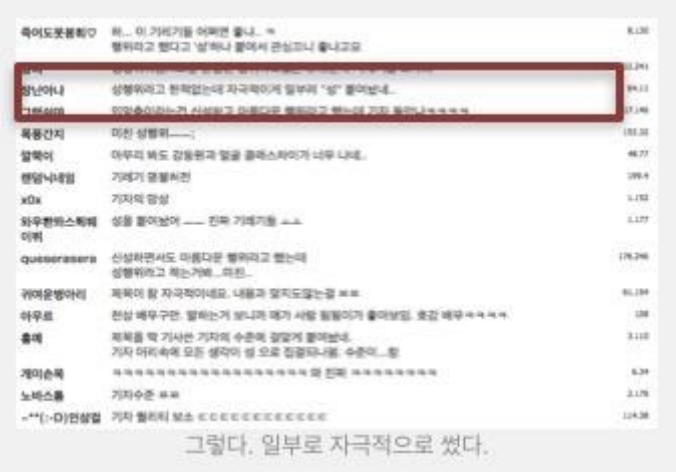
이러한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다 .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 듣고 싶어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언론사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이 타락했다고 말하는데 , 어떤 말이 통할까 ? 언론사들은 자신만의 ' 색깔 ' 을 지녔고 그러한 ' 색깔 ' 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흥미있는 기사들을 쏟아 내기 마련이고 , 그래야만 한다 .

' 전체 ' 군중이나 ' 나 ' 라는 개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언론의 의무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 군중은 절대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 군중은 철저히 ' 프레임 ' 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 이는 ' 집단지성 ' 의 한계에 의한 특징으로 집단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고증이 이루어진 상황다 .

실제로 , 어떠한 기사가 올라왔을 때 , 기사에 대한 최초 댓글 10% 가 전체 여론이 되는 경우가 많다 . 특별하게 자신만의 투철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 프레임 ' 에 휩쓸리는 경향이 강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

따라서 , 언론은 자신만의 중심이나 색깔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다 . 군중들의 반응으로 그 중심을 이리저리 바꾼다면 , 오히려 군중들이 사실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 없다 . 군중들에게는 다양한 입장을 갖는 언론들을 비교해 보며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편이 이롭다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 언론을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고유한 단위객체로 바라봐야 한다 . 어떠한 사실에 대해 고유한 색깔과 중심을 내세우며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고 , 여론을 파괴하기도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 것이다 . 권선징악 구도로 언론을 바라봐선 안 된다 . 못된 탐관오리 혼내 주는 느낌의 현재 좌파 언론사들도 과거에는 집권당의 강력한 버팀목이었다 .



언론의 방향과 스타일을 통제하려는 시도도 무의미하다 . 현재 언론을 이렇게 만든 것은 군중이다 . 네티즌들은 특정 패턴의 기사들에 대해 기사와 쓰레기를 합친 신조어인 ' 기레기 ' 라며 비난의 댓글을 퍼붓는다 . 이 기사들은 대다수가 연예인들의 ' 셀카 ' 가 담긴 기사였다 . 내용이 10 줄 이내로 짧은 , 일명 ' 짤짤이 ' 기사였다 . 언론이 왜 이런 ' 짤짤이 ' 를 하게 된건가 ?

필자가 인턴기자를 하던시절 , 회심을 기울여 몇 주를 고민해 써 낸 기사들이 얼마나 읽혔나 보니 , 1000 명도 읽지 않았다 . 그런데 , 10 줄도 되지 않는 자극적 기사들이 이 수치를 쉽게 넘긴다. 특히 , 연예인 강예빈의 노출사진이 담긴 기사를 올리면 수 만명의 네티즌들이 힘차게 클릭한다. 군중의 의견들을 곧이 곧대로 반영할 수 없는 이유다 .

즉 , 어떠한 방향으로 언론이 바뀌더라도 군중을 만족시킬 수 없다 . 언론은 군중의 사랑과 욕을 동시에 먹으면서 성장한다 . 그게 언론의 역할에 대한 모순이다 .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할 필요도 없다 . 사람들은 이러한 언론을 보며 즐거워하고 원하는 소식을 접한다 .

정치적 쟁점에 대한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 실제로 언론이 타락한 경우도 많고 , 그렇지 못한데 군중들이 여론을 몰아간 경우도 많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언론사와 균형을 맞춰가야 할 것이다 . 물론 , 그에 대한 공정한 심판은 군중들의 손에 달려있다 .

언론은 우리와 함께 만들어지는 것임을 명심하자 .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닐 뿐더러 , 언론사가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니다 . 자신에게 맞지 않는 언론들을 언급하며 언론이 타락했다는 전체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 언론을 설득의 도구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보인다 .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이동욱(서울경제3), 박의현 (서울경제3), 유승진 (서울경제3), 손계준 (서울지리3), 이동한 (서울경제3), 김성욱 (서울경제3),

손계준(서울지리 3):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21 세기 미디어 시대에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대립과 반목,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이 사회 통합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언론이 다뤄줬으면 하는 이슈들을 각자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의현(서울경제 3): 기본적으로 언론이 이미 중요한 사회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나오면 언론이 일정 정도 사실을 조작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정치인, 공직자 중에 받고 있던 혐의가 무혐의가 되면서 어느 연예인의 사적인 치부가 공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아, 또 어떤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점점 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무효로 만들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을 우선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언론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진실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언론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승진(서울경제 3):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최근 국정원 사건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직기관, 언론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치, 사회적인 이슈들을 좀 더 부각시켜야 할 것 같고 진실보도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동욱(서울경제 3):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언론이 대중에게 전파를 하면서 자신들은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항상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는 자체가 각각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어 교과서에서도 '가장 주관적인 언론이 가장 객관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이 '보수' 혹은 '진보'를 대표하고 또 그런 인식을 받고 있는데, 모든 언론들은 자신들이 내보내는 정보들이 전부 객관적이라고 선전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들은 자칫 잘못된 정보를, 또는 사고를 가지기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각자의 주관적인 방향성과 기준들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내고, 각각의 논리들이 공개된 장에서 건전하게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중들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이 마련되면 언론도 부족한 시민의식을 계도하고 선진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다양한 소스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욱(서울경제 3): 기본적으로 언론이 해야 하는 역할이 사회통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분업'의 기능처럼 언론이 대신해서 알기 힘든 정보들을 많이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그렇게 얻어 낸 정보들을 대중에게 전파함으로써 정보가 재생산되고 이를 수용하는 대중들에게도 풍부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은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행동을 정의하고 방향성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언론의 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동욱 학우의 얘기도 동감하는데 종편채널도 그렇고 일반 프로그램을 보면 '토론'프로그램이 많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토론에서 각각 양쪽의 견해가 있는데 수용자들은 그들의 논리적인 주장들을 바탕으로 자기의 방향성을 잡아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비판적인 수용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가끔 사회자가 한 쪽에 치우친 견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은 구조적인 권력을 짜는 맥락에서 '게이트 키퍼'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사회 단계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익, 생각 등을 정치체계로 투입하는 데 언론이 이를 여과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동한(서울경제 3): 언론의 기본적 역할은 권력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숨기려고 하는 정보들을 언론이 밝혀내서 사실로서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의 언론은 건전한 방향으로 견제를 한다기보다는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적 이슈보다는 좀 더 자극적인 이슈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이슈들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야를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뤄야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계준(서울지리 3): 네, 여러분의 말을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은 제 역할을 다 하려고 해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도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각종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창'의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할까요?



박의현(서울경제 3):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이 사회적 문제들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너무 자주 보도를 하면 오히려 언론이 권력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계도하고 올바른 행동 등 도덕적인 관념을 고취시키려는 행동들이 자칫하면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데요,

현재 언론의 역할, 즉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보도하고 대중들에게 교양 등을 제공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히 시민의식을 선진화하는데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서울경제 3): 박의현 학우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언론은 각자가 정립하고자 하는 스탠스를 분명 갖고 있고, 이를 숨기고 우리는 무조건 객관적이며 사실만을 보도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자신들의 색깔은 숨김 없이, 여과 없이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판단을 대중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언론들을 보면 어떤 언론은 보수, 진보, 그리고 A 라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등의 언급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언론들도 자신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 다양한 방향성이 존재하게 되고 대중들은 여러 방향성 중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당하거나 논리적인 방향을 택할 수 있는 동시에 반대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비판적 수용자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욱(서울경제 3): 이동욱 학우의 이야기는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언론들처럼 모든 언론이 자신의 스탠스를 밝히고 그러한 방향의 보도를 하게 된다면, 만약 다수의 대중들에게 외면 받고 결과적으로 도태되는 언론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다수 언론사의 경우, 자신의 스탠스가 이렇다 할지라도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면 존속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스탠스를 숨기는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이 자율성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광고주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광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광고주들이 광고를 싣기 위해 일정 기금을 펀딩하는 것인데요,

광고를 하기 위해 펀딩을 하고, 그 기금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적절하게 신문사들에 배분되어 소규모 언론사들의 숨통도 틔워주는 동시에 주류 신문들이 특정 기업에 편향되는 현상을 예방하는 기능도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승진(서울경제 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 무엇보다도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대중들의 사고나 행동패턴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건전한 방향으로 사회통합을 이끄는 역할이 선진화된 사회를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기 보다는, 대중들의 의견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또는 저지르는 좋지 않은 행동들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사회 각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언론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파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한(서울경제 3): 네, 저도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시민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직접적인 방법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1 차적인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양심 냉장고', '사회 고발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물론 의도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착한 일, 사회 질서를 지키고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보상을 주는 것과, 반대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잠입하여 취재 및 고발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언론이 그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례로 '먹거리 X 파일'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온갖 먹거리들에 대해 고발을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지점들도 많아졌는데요,

이처럼 모든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이 잘못되었고, 잘못한 사람을 벌주는 1 차적인 접근보다 2 차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지양하고 의식을 계도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지는 좋으나 자칫 부작용이 더 커져서 의도한 결과보다 손실이 크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언론의 역할이 정해져야 할 텐데요, 선진국의 시민의식 수준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전파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손계준(서울지리 3):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언론이 처해있는 문제점과 지향해야 하는 방향들, 그리고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언론들이 자신의 스탠스를 보여주면 다양한 방향성을 대중들이 선택하고 자신의 입장을 세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재정자립과 자율성 또한 중요하며, 시민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방법보다도 2 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김용(일본 교환학생), Kazym(카자흐스탄 교환학생), 이다솜(불어불문2),
유예슬(영어교육1), 장주은(아시아문명1), 장수림(러어러문2)

이효정(불어교육 2): 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언론이 사회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언론은 그 사회를 바라보는 창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겠죠?

언론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아주 다양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사회를 고발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언론이 어떻게 사회의 선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각 나라마다 살펴 보도록 하죠.

특별히 오늘은 교환학생이 두 명이나 참가해 주어서 보다 더 생생하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im Yong(일본 교환학생): 일본은 신문을 매우 즐겨 읽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일본 사람들은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일본이 선진국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언론은 아직 선진화되지 못한 면모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 언론들은 지나치게 황실을 옹호하기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역사 인식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하여 다른 국가들과 외교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죠. 하지만 일본의 신문이 국민들을 계몽하는 것에 쓰였다는 점은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효정(불어교육 2): 그렇군요, 카자흐스탄의 언론과 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Nazym(카자흐스탄 교환학생):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법과대학에 진학하고 있을 정도로 우수한 교육을 받은 편임에도 불과하고 신문과 언론은 조금 생소한 주제예요. 사실 대부분의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신문을 읽지 않아요.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 지나치게 권력 옹호적인 것 만이어서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큰 이유이죠. 그런 점에서 전 일본이나 한국처럼 언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국가가 부럽기도 해요.

제 생각엔 언론들이 사회를 선진화하는 것에 막중한 의무와 또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 언론들의 경우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이효정(불어교육 2): 그럼 이번엔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자국의 자존심을 '르 몽드'지라고 할 만큼 언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라의 요리 가지 수 만큼 다양한 언론을 보유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다솜(불어불문 2): 프랑스의 언론들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직 전자 언론이 아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진 않습니다. 신문의 전통 강호들이 힘을 가지고 있죠. 프랑스는 전국구로 신문을 발간하기도 하지만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신문들을 발전시킴으로써 각 지방이 자신들의 특징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는 77 개의 지방 신문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각 지방의 담론들의 토론장을 형성함으로써 지방 분권적인 체계를 유지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중앙, 동아 일보가 신문 시장 점유율의 2/3 이상을 차지 하는 것과는 무척 다른 행보이죠.

지역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지역지들이 큰 담론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프랑스의 전반적인 정책과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랑스의 특징은 유럽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유예송(영어교육 1):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미국이라는 사회가 유지 될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바로 '뉴욕 타임즈'로 대표되는 미국의 언론입니다.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시대의 정 가운데에 놓아 놓고자 합니다. 미국 사회가 과연 현재 몇 분인지, 그렇다면 미국 언론은 몇 시에 위치해야 하는지 시대를 주시하고 그에 합당한 평가와 판단을 보도하고자 하죠.

그래서 인지 미국은 세계를 아우르는 유명한 기자들을 많이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뉴욕 타임즈의 경우는 기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퓰리처상을 탄 기자들이 69 명이나 나왔죠. 이들은 모두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기사를 보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효정(불어교육 2): 그리고 비교적 광고료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신문과 같은 언론사들이 광고 수입료가 주 수입원이라는 점을 가정했을 때 광고 대신에 대통령 기자 회견의 전문을 싣는 미국의 언론은 꽤 선구적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가요?

강주은(아시아문명 1): 얼마전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은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통제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공산주의적인 법칙들을 고수하는 중국은 자유로운 주제에 대한 토론이 막혀있는 국가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2011 년부터는 모든 블로그와 트위터 등의 인터넷 SNS 활동에서 실명제를 확산 실시하면서 인터넷 언론 매체에 관한 정부의 관리 및 검열이 더욱 엄격해진 상태입니다.

중국언론은 충분히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강수림(러어러문 2): 저는 러시아의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 언론에 대해서 가장 친숙하게 접하게 된 것은 김연아 선수를 러시아 언론이 비중있게 다루면서부터일 것입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언론들은 문화나 예술, 스포츠 방면의 소식들을 비중 있게 다룸으로 사회의 선진화의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미국과의 스파이 이야기라던지, 지나친 언론 탄압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은 모두 근거 없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효정(불어교육 2):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에서 언론과 사회의 선진화 정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국가이던지 언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②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동석(이하 연세경영2), 조은지, 이규상, 김기동, 장유진, 김보민

이동석(연세경영 2): 그럼 지금부터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요즘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우리나라 언론들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의 역할을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선진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언론이 되기 위해선 공정성, 독립성이 필요한가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규상(연세경영 2): 저는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 6 층에 가면 전자 스크린으로 여러 신문사의 신문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곳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관련된 1 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결과 신문사별로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같은 보수적인 신문사의 경우, '이석기, 이정희 무죄를 주장하자 방청석에서 북한으로 보내' 라는 식의 제목을 뽑은 반면 한겨례와 경향신문 같은 경우 '정당들의 자유가 침해될까 우려' 라는 식의 제목을 실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론에 독자들이 계속해서 노출될 경우 사건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이 한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독자들을 그에 맞추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고 언론의 역할은 정보의 제공에 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유진(연세경영 2): 저는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언론이 되기 위해선 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3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이념과 가치관의 문제, 둘째로 SNS 의 발달, 마지막으로 역사의식과 관련 지어 생각해보았습니다.

근 백 년 간 현대사회는 이념의 시대라고 할 만큼 이념 갈등이 심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각 개인의 다양한 가치관, 철학이 존재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흐름 속에서 어디 한 곳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각각의 이념과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한 쪽으로 휩쓸리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SNS 가 엄청나게 발달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모두 간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파급력 역시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SNS 을 통한 여론의 형성이 지금보다 훨씬 용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언론이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여론을 형성하거나 하려는 노력을 할 경우 SNS 을 통한 그에 대한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빠르고 클 것 같습니다. 이렇기에 더더욱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 역사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언론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한 의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한국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된 유영익 위원장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한 극우파입니다. 2017 학년도부터 국사가 필수과목이 된 지금,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들은 뉴라이트를 비롯한 극우파들의 역사인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한 종편 프로그램에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출현해 교학사의 교과서만이 정상적이고 나머지는 좌 편향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물론 역사라는 것이 과거의 사실과 더불어 현재 역사가들의 해석과 평가가 뒷받침되어 완성되는 것이지만 저는 전자, 즉 과거의 순수한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은 각자의 해석을 넣어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사 과목이 의무화된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처럼 한 나라의 역사인식은 우리 사회를 선진화하고 건강하게 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연세경영 2): 선진시민사회라는 것은 일단 시민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공정성이란 어떤 한 사건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언론의 독립성이란, 언론이 어느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고 언론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언론은 시민들 스스로 여론을 형성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즉, 선진시민사회로 나아가게 도와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없을 것이고, 본인들의 여론 형성에도 장애를 겪을 것입니다. 이는 선진시민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공정성과 독립성은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본인들의 여론형성이라는 주체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는 또 시민사회와 대비되는 국가가 비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민(연세경영 2): 저도 비슷하게 언론은 사회 담론을 담는 역할을 하므로 일부 세력의 이해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언론의 기능에는 보도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정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정성의 개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저는 한 시민이 언론의 선택에 자유만 있다면 언론들이 각자의 색깔을 띠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공정성이란 한 신문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입장을 가진 언론이 있어야 한다는 말 같습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만약 모든 언론이 공정하게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도한다면 우린 1 개의 언론사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즉, 김보민 학우의 말은 이념에 관해서든, 역사 문제에 관해서든 무조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각각의 다양한 이념과 생각을 표현하는 언론만 존재한다면 그 후는 받아들이는 시민의 몫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강유진(연세경영 2): 저도 그 방향으로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은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규상(연세경영 2): 저는 아까 사회자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정치권력에 한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선진시민의식과 관련한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언론의 독립성이라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내용인데, 그 것을 제외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동석(연세경영 2):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리해보자면 언론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선진시민의식을 위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이쯤에서 첫 번째 질문인 왜 선진시민의식을 위해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인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론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상(연세경영 2): 저는 크게 3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로 온라인 매체가 발달한 현재 사회인 만큼 언론사와 독자들간의 공공 대화 공간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론기관이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금전적으로 독자층에게 의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하는 공적 역할에 대해 정부가 인정해주어 정당에게 주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강유진(연세경영 2): 일단 제가 생각한 것은 신문이나 언론 매체들이 다루는 안건들에 대해서 그 안건에 대한 일종의 시민 기자 제도를 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시민들이 보도하게 하거나 시민기자의 생각을 기존 보도에 첨가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 기자 제도를 둔다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겠지만 더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을 보도에 반영할 수 있어 언론의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안을 이야기 하기 전 얼마 전 100 분 토론에서 역사문제에 관해 논쟁을 하는 것을 본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때 기억을 떠올려보면 어느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의견이 대립되어 도저히 하나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언론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두 번째 방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에 한해서는 언론이 어떠한 주관을 집어넣지 말고 양쪽 의견을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보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지(연세경영 2): 저 같은 경우 제가 그 동안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단어 하나 때문에 뉘앙스나 의미가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정부 차원에서 언론이 보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단어들을 정리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요즘 사람들의 신문 구독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방송이나 인터넷 언론에 한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팟캐스트와 같은 프롤로그 독립 언론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전 '나꼼수' 같은 개념의 언론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언론이 큰 언론사들과의 작용 반작용적인 개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을 지금보다 좀 더 키우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방송사인 KBS 와 MBC 의 경우 사장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언론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뉴스와 관련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네이버 뉴스와 같이 정치, 사회 별로 항목별로 신문사를 나누어 배열하도록 권장한다면 사람들이 한눈에 여러 가지 뉴스를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인터넷 뉴스에 헤드라인이 대부분 선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숨어있는 문제는 사실관계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빠르고 자극적이게 보도를 하다 보니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동(연세경영 2): 저는 언론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민을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도의적 책임감도 언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가는 세미나의 개념을 언론사에도 적용해서 기회가 날 때마다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언론인이 가져야 할 자세나 소양에 대해서 재교육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라는 또 다른 정치권력의 경우 언론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해 주기에는 그 속성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3 자의 입장에 있는 사법부에서 이 것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민(연세경영 2): 저는 첫째로 정치적인 제도, 둘째로 시민차원, 셋째로 언론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외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언론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언론을 이용, 활용하기 보다는 언론의 비판을 좀 더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사에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완력을 행사할 수 없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민 차원에서는 요즘 1 인 미디어처럼 대안 언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기존 기성 언론에 실망하면 할수록 점점 더 대안 언론에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성 언론 역시 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대안 언론이 활성화가 되고 수용하는 시민들이 기성 언론의 공정하지 못한 점 등을 비판한다면 기성 언론 역시 공정하고 독립적인 언론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에서는 경영진의 언론 통제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언론사에서는 편집권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사 경영진과 편집진과의 강력한 협약을 맺어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이규상(연세경영 2): 조은지 학우님과 김보민 학우님께서 모두 팟캐스트와 같은 대안 미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그런 경우는 거대 언론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전문성과 자본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주목을 받기 위해 자극적이고 한쪽에 치우친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성 언론의 대안으로 제시하기 전에 대안 미디어들 스스로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은지(연세경영 2): 음,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은 어느 하나가 선결과제로서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통해 동반상승을 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언론이 아무리 공정하고 독립적이게 보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여된 채 수용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진시민의식을 위해 언론의 역할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과 언론의 역할을 다 같이 성숙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모르던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선진시민의식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박노준(이대교육2), 이어진(이대교육2), 장서현(이대교육2)

송현지(이대교육 2): 먼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미리 메일로 초청장과 토론문을 보내드렸듯이 지난 10 월 24 일, 언론과 선진시민의식에 관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의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 라는 주제를 가지고 'SNS 와 함께 실종된 시민의식,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통해 준법, 정직, 배려 등의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려면,

언론이 길을 열고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시민의식 함양 캠페인들에 언론이 참여하여 함께 진행한다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캠페인 중에서도 TV 를 통한 공익광고나 신문을 통한 캠페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배려, 정직, 감사, 질서 등의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언론의 역할 중 캠페인을 통한 선진시민의식 고취의 좋은 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언론 캠페인을 통한 선진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합니다.

장서현(이대교육 2): TV 에서 학교폭력 캠페인을 본 적이 있는데, 이보영씨나 아이유 등의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해서 돌아가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한마디씩 하면서 캠페인을 찍은 건데,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자 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관심을 끌 수 있겠더라구요.

이어진(이대교육 2): MBC 무한도전과 같은 선진시민의식 캠페인의 메시지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 등의 좋은 TV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좋은 메시지를 전달과 시청률을 위한 오락적 요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장서현(이대교육 2): 네, 맞아요. 지난해 2 학기 때 학교에서 우리말과 글쓰기라는 교양강의를 들었었는데, 제가 썼던 소논문 주제가 대학 신입생 음주 문화였어요. 잘못된 음주문화에 대한 참신한 해결 방안을 찾다가 MBC 느낌표 프로그램이었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라는 프로그램이 생각났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시민대상 캠페인으로 책을 많이 읽도록 독려하는 등 여러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을 접목한 프로그램 만들면 어떨까 제안했었는데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시청률이 낮아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폐지되고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신설되다 보니 안타까워요.

박노원(이대교육 2): TV 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접하는 매체니까 각 방송사들이 선진시민의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이전의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되살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MBC 일요일일요일밤에 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경규가 간다, 숨은 양심을 찾아서!' 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새벽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는 차량을 기다렸다가 냉장고를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선진시민의식을 고취시켰던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되살리는 것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진(이대교육 2):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청률도 중요하죠. 시청률이 낮으면 폐지도 물론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돈만을 위해, 시청률만을 위해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업적인 시각보다는 언론이 가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장서현(이대교육 2): 저도 공감해요. 언론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특히 공중파방송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은 주로 EBS 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주제는 공영방송인 KBS1 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시청률이 높은 예능 등에 접목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최근 인기가 많은 축구선수 송종국씨와 딸인 송지아양이 함께 찍은 112 캠페인이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시청하는 인기가요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안전운전송 캠페인 등은 다양한 연령층에 어필하는 캠페인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박노원(이대교육 2): EBS 에서 방송하는 지식채널 e 의 경우에는 한 가지 주제로 짧은 시간 동안 감성을 자극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딱딱한 주제도 사진, 텍스트, 음악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흥미를 눈길을 끌게 잘 만들어서 교수님들께서 대학 강의에서 자주 보여주시기도 해요.

이러한 방식을 EBS 뿐만 아니라 KBS 와 같은 다른 공중파 방송에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고정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광고 형식이나 브릿지(Bridge) 형식으로 잠깐씩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메시지 전달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어진(이대교육 2): 맞아요. 막상 보면 재미있고 의미도 있는데, 그런데 막상 EBS 채널을 틀어서굳이 지식채널 e 를 기다려서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따라서 프로그램 중간의 광고 시간에 그 잠깐의 광고들로 방송사는 굉장한 수익을 올리겠지만 그래도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 시간에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서현(이대교육 2): 아니면 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통해 강제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프로그램 중간의 광고시간에 반드시 넣어라 와 같은. 배려하기 캠페인과 같은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캠페인의 연중기획 및 방영을 의무화 시키는 방법도요.

송현지(이대교육 2): 저는 요즘 대학생들도 인성교육이 부족한 탓인지,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분위기 탓인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대형강의를 들으면 한 사람이 친구들을 위해 대여섯 자리씩 맡아놓아서 지정좌석제도를 도입하는 강의도 많아졌죠.

이외에도 도서관사석화, 도서장기연체, 수업 중 핸드폰을 이용한 소음유발 등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과연 대학생들의 배려의식을 위한 캠페인도 언론이 할 수 있을까요?

박노원(이대교육 2): 언론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계속 제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시민들이 자주 접속하는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 메인에 요즘 대학생들 수업을 보면 배려 없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라는 세태보고를 흥미롭게 하고,

그런 내용에 댓글들이 쭉 달리면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니까 은연중에 머리속에서 생각을 하게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포털 사이트 메인에 광고 하나 올리는 것이 굉장한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하던데요. 이윤을 내는 것보다도 언론의 사회적 의식을 강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죠.

이어진(이대교육 2): 맞아요. 그리고 네이버에 접속해보면 맨 처음 들어갔을 때 한쪽에 영상이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곳에 나오는 광고들 대신에 캠페인 영상을 일정시간 노출시킨다면, 움직이는 영상이 제일 먼저 사람들 눈에 띄니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 말했던 학교폭력에 관련된 공익광고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연예인들이 등장해서 그런 캠페인을 하면 더 사람들의 눈길과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새로운 정보를 담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공익광고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

송현지(이대교육 2):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언론이 고취시켜야 할 다양한 선진시민의식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노원(이대교육 2): 저는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사회의 비리, 부정부패에 관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이를 인식한 정부기관들도 비리척결을 외치고 있죠. 세금을 내면서도 공무원의 비리를 걱정한다면 사회의 공동체 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이어진(이대교육 2): 저도 정직이라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신뢰도 부족하고 이렇게 서로를 믿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서현(이대교육 2): 그래서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캠페인도 무시되기 십상인 것 같아요. 이거 해서 뭐가 효과가 있어? 이윤 때문에 하는 것 아니야? 연예인들 이거 얼마 받고 찍었을까? 또한 캠페인의 진정성도 의심하게 되죠.

예전에 모조품 관련 캠페인이 있었는데, 진품과 모조품이 있는데 모조품을 사면 진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망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파괴되는 식으로 브랜드가치 하락과 가정파괴로 인해 결국 대한민국 망한다는 그런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캠페인이었어요.

올바른 소비의식을 위한 좋은 의도의 캠페인이었지만 비약이 심하다며 이러한 캠페인들을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보다는 의도와 진정성부터 의심했던 것 같아요.

박노원(이대교육 2): 맞아요. 저도 예전에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공익광고를 본 적이 있었는데,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저렇게라도 국민들의 사기를 올리려 하나 이런 시선으로 삐딱하게 봤었거든요.

국민들이 캠페인을 통해 진정한 선진시민의식을 가지도록 하려면 캠페인이 언론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행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정직한 언론의 운영 행태에 대한 고민도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송현지(이대교육 2): 네, 여러분들께서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근, SNS 가 언론의 역할 많이 하고 있는데요, SNS 가 아직 기존언론의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적절한 제재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SNS 의 순기능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전까지는 기존 언론이 캠페인 등을 통해 선진시민의식을 고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문사가 기업과 손잡고 휴마트 인성교육이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이 인터넷신문과 결연하여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해온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포럼과 대학생 홍보대사들의 노력을 네티즌들에게 알리는 것도 이와 같은 노력의 예가 될 수 있겠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본 것처럼 공익성을 염두에 둔 캠페인을 통해 국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언론이 선진화된 시민의식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번 연구모임을 진행해보았는데요,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 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④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서영채, 박제진, 공현덕 (삼육경영 2)

김영재(삼육경영 2):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미디어기술의 발달로 우리 주변엔 방송, 신문뿐만 아니라 포털,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들이 생겨났고 저마다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지만 그에 반해 국민들의 선진의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언론의 역할이 의제를 선정하고 사회적 계몽의 선도였다면 이제는 근거와 배경설명 없이 떠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독자들에게 필요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를 매개하고 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언론이 현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국민들의 의식도 한층 발전할 수 있었겠지만 경쟁이 과열된 시장 속에서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 이익만을 쫓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발전시키 위한 언론의 역할과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 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영채(삼육경영 2): 최근까지는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았다면 이젠 오히려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진(삼육경영 2): 네, 저도 요즘은 굳이 신문이 아니더라도 SNS 를 통해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현덕(삼육경영 2): 최근 여의도 불꽃 축제 때 축제를 보러 갔던 시민들이 단체로 올림픽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모습과 불꽃 축제 후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언론이 공개 보도해서 시민들이 자아성찰을 할 수 있게끔 시민의식의 현실을 보여줘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느끼게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채(삼육경영 2): 요즘에는 굳이 언론이 아니더라도 SNS 를 통해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민폐 동영상 같은 것들이요. 이런 동영상이 올라오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고 공유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조금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나쁜 사례를 보여줘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국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일단 욕부터 하는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그런 동영상들 중 간혹 외국에서도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제적 이미지도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진(삼육경영 2): 요즘 인터넷을 보면 무작정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런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겠네요. 국제적 이미지 하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현덕(삼육경영 2):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나쁜 사례만 보여주지 않고 좋은 사례들도 함께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굳이 국내 사례가 아니더라도 시민 의식 수준이 더 높은 외국의 사례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네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적절히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선진 시민 의식 발전을 위해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 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언론이 시민 의식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서영채(삼육경영 2): 저는 편향된 언론이 소비자들의 갈등을 유발함은 물론 시민 의식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하나인데 그에 대해 보수와 진보로 나뉜 언론들이 너무나도 상이한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특히 배경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진(삼육경영 2): 네 맞습니다.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것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은 물론 많은 성인들도 언론이 생산하는 정보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기본 지식 부족이라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론의 편향된 성향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가 없듯이 언론의 생각이 다른 것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현덕(삼육경영 2): 그 말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하기 위해선 그 정보에 대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선 소비자들이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네,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문제는 요즘 언론들이 너무 수익 창출만을 목표라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영을 위해선 수익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곤 해도 요즘의 언론들, 특히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눈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고민의 흔적이라곤 보이지 않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라는 사진을 퍼온 기사들과 연예인들의 노출 기사, 기사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들과 기사를 둘러싸고 있는 성인 광고들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서엉채(삼육경영 2): 저도 그런 부분들은 보면서도 정말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활자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무료로 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광고료가 주 수입원인 언론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제진(삼육경영 2):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질 기사라고 욕하고 흉보긴 하지만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의 기사의 경우에는 일단 궁금하기 때문에 클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진중한 내용의 기사들은 사람들이 일단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지루해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낮다고 합니다. 무작정 언론을 욕할 수만도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그렇게 생각해보니 언론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저질 정보들은 분명 문제입니다. 이를 완화 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공현덕(삼육경영 2): 저는 인터넷 신문의 운영 제도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P3 가 처음 등장 했을 때 많은 가수들은 MP3 가 아닌 CD 를 구매해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더 작고 간편한 MP3 를 선택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처음엔 무료로 풀려있던 음원들이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된 문제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많은 가수들이 정규앨범을 발매하지 않고 디지털 싱글 앨범이란 형식으로 음원을 공개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론의 경우에는 CD 를 활자 신문, MP3 를 인터넷 신문이라고 생각하여 포털에서 인터넷 신문을 접하는 대신 인터넷 신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박제진(삼육경영 2):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제 생각엔 기사는 음악과 기본적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언론의 양보를 기대하는 편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네, 언론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재정적 독립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많이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민의식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현 언론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시민 의식 발전을 위해 언론이 할 수 있는 일로는 경각심을 깨워 줄 사례와 본보기가 되어 줄 사례를 보도하는 것, 현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편향성과 재정적 독립 문제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언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이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론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좋은 생각이 나신다면 서로 얘기 나누며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⑤ 인천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우갑 (인천 정외 3):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진 시민 의식의 고취를 위해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토론해 보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사실을 보도하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진 시민 의식의 고취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언론에서는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이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인천 정외 4) 학우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언론들이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발제자가 칼럼에 쓰셨듯이 이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도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돈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종 돈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공익적인 프로그램 만들라고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자의 자질도 자극적인 프로그램 제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전형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보다는 기자로서의 혜택을 더 많이 주면 되요. 기자라는 직함을 가지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변호사, 의사처럼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우수한 인재가 몰리게 되고, 그 경쟁 속에서 우수한 인재가 선발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자 되기가 변호사나 의사에 비해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런데 그 중요성은 변호사나 의사 못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에 준하는 대우를 기자에게 충분히 해주어야 우수한 인재가 질적으로 우수한 기사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우수한 인재가 기자로 선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편집장이나 사장들은 시청률이나 구독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선정적인 컨텐츠는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지훈 (인천 정외 4):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재정적 지원과 기자에 대한 혜택 부여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장지구 (인천 산경 4): 저는 기자들을 채용할 때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자뿐만 아니라 언론사를 운영하는 관계자들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도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장의 지시에 기업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MBC 가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사장의 임명이 정부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아무리 공정하게 사장을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사장은 암묵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올바른 기자들이나 언론 제작자들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지훈 (인천 정외 4): 그런데 KBS, MBC 는 준 공기업인데 공기업의 사장을 정부가 선발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장지구 (인천 산경 4): 방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영향력이 막강하고, 언론의 역할 중에 권력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언론사의 사장을 임명해버린다면 이것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의 경우에는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장의 임명에 있어서 예외를 두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그렇다면 모든 언론사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지구 (인천 산경 4): 민영화라기 보다는 정부가 언론사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되 사장의 의사 결정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정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언론사 내부나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저희가 토론하려던 선진 시민 의식의 고취에서 벗어나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장지구 (인천 산경 4) 학우님의 말씀처럼 언론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언론이 더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칼럼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채동욱 검찰 총장의 혼외 자식 보도와 같이 사실 확인도 안된 것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이윤을 위한 비윤리라고 볼 수 있는데 선진 시민 의식을 고취하여야 할 언론이 오히려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만연 (인천 정외 3):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선진 시민 의식의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재정적 지원이 가장 우선시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고 규제하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작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코피노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우리 사회에 코피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공익 방송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공익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인천 중어 3): 저는 공익방송에 대해서 시청률 최저 보장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저 수준만 넘으면 지원을 해준다면 공익 방송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공익 방송들이 많은데 사람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서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시간대를 조정해서 공익 방송들을 방영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에는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황금 시간대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방송을 많이 내보냅니다.

하지만 황금 시간대에 공익 방송을 방영하게 한다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공익 방송에 노출되고, 그 결과 선진 시민 의식이 고취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재승 (인천 정외 3): 공익 방송을 황금 시간대에 방영 하더라도 사람들이 공익 방송에 관심이 없다면 공익 방송뿐만 아니라 원래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던 방송도 시청률이 낮아지는 피해를 받게 될 텐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청률 최저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공익 방송을 보지 않는다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작하도록 하는 게 선진 시민 의식의 고취를 위해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전 검열인 게이트 키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검열이라고 해서 방송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은 자유롭게 만들어라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적인 것보다는 공익적인 내용을 만들라는 식의 필터링을 방통위가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인천 중어 3): 물론 공익 방송의 시청률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익 방송이라고 한다면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이 봐도 지루함을 느끼기보다는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등 계속 독려를 해야 하지 시청률이 낮다고 제작을 기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SBS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다들 한번씩 보셨을 거예요. 런닝맨에서 차를 타고 이동할때가 있잖아요. 그 때 출연자들이 안전벨트를 매는데 안전벨트에 안전벨트 의무화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어떻게 보면 예능에서 선진 시민 의식을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공익적인 요소를 넣는다면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희진 (인천 문정 2):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포털 사이트나 주변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 괜찮다고 꼭 봐보라고 해서 재방송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공익 방송 중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큼 재미있는 방송을 만든다면 본 방송 때 시청률은 잘 안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선진 시민 의식 고취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덧붙여서 말하자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까 전에 코피노의 눈물도 포털 사이트에 호평이 많아서 찾아 본 것이었거든요. 이 다큐멘터리처럼 찾아보면 재미있으면서도 공익성 있는 방송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따라서 아까 전에 김민수 (인천 중어 3) 학우가 말했던 것처럼 황금 시간대에 공익 방송을 강제로 노출시키고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홍보를 한다면 당장 시청률은 나오지 않더라도 선진 시민 의식 고취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즉, 노출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황금 시간대인 일요일 오후 8 시에 하는 드라마나 프로그램들 중에 망한 것이 없어요. 틀어놓기만 해도 시청률이 10%가 넘는데 만약 공익 방송이 황금 시간대에 방영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막말 방송 같은 경우 방송사에서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꺼려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만연화 되다 보니까 현재에는 그런 것들이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고, 시청자들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익 방송들이 계속 방영된다면 시청자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더 많은 공익 방송들이 창출될 거라 생각합니다.

장지구 (인천 산경 4): 하지만 황금 시간대에 강제로 공익 방송을 편성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고요. 황금 시간대에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것이 엄청난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방송사에게 너무나 큰 규제를 하는 것이죠.

조지훈 (인천 정외 4): 하지만 방송사의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익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인천 중어 3): 그리고 공익 방송이라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면 가져다 주었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황금 시간대에 방영을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요?

이만연 (인천 정외 3): 그런데 이것은 방송사의 자율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장지구 (인천 산경 4): 공익성 때문에 공익 방송을 틀어 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틀어 놓는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 시청을 하고, 어느 정도나 우리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가 불분명한데 자율 편성권까지 침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언론이 선진 의식 고취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거나 더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연 (인천 정외 3): 공익 방송을 사람들이 잘 안보는 이유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방송에 대한 광고를 활발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승 (인천 정외 3): 맞춤형 공익 방송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공익 방송을 안 보는 이유는 재미가 없기도 하지만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맞춤형 공익 방송들을 제작하여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희진 (인천 문정 2): 차등적 인센티브 제를 도입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에를 들면 1 등에게는 전에 지원해주던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은 제작 비용을 준다거나 하는 거죠.

장지구 (인천 산경 4):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면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하철,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을 활용하여 공익 방송을 노출시킴으로써 선진 시민 의식의 고취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인천 경영 1): 저는 소셜 펀딩을 생각해 봤어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면 모금을 통해 제작 비용을 마련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공익 방송을 만들도록 한다면 더 많은 공익 방송이 제작됨과 동시에 선진 시민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밤 늦은 시간까지 토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⑥ 상명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재혁(상명국통3),한승규(상명일교3),
김필수(광운법학3),허유민(한양컴공2)

김재혁(상명국통 3) : 안녕하세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학우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선진화포럼 79 차 월례토론회 주제였던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모습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두 번째로 공영방송인 KBS 의 수신료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김필수(광운법학 3) : 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이 잘한다고는 볼 순 없지만 나름대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언론이 진보, 보수 등의 입장으로 너무 극단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도 동의하진 않습니다. 우리 언론은 나름대로의 정치적 성향을 띠면서도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에 쉽게 매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론 보도에 대해 주체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의식수준을 계속해서 증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언론도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보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허유민(한양컴공 2) : 저는 김필수 학우분과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은 진실을 알리는데 매우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진실보도와 사실보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보도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적인 부분만 보도하는 반면, 진실보도는 그 사건에 숨겨있는 인과관계와 정보, 진실등을 파악하여 대중들에게 알리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현재 이러한 진실보도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진실보도를 하기 위해선 기사 선정과 작성에 있어서 오랜 필터링 작업과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 언론은 대중들에게 쉽게 주목받을 수 있고 이슈화되는 기사들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언론의 성숙, 특히 대중들에게 양질의 정보만을 전달하겠다는 양심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대중들 역시도 이슈화되는 기삿거리에만 집중하고 시시비비를 논할 것이 아니라 참 진실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언론보도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언론의 참된 진실보도 추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한국선진화포럼)

한승규(상명일교 3) : 저는 김필수 학우분과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요. 언론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진보, 보수등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 언론사별로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너무 극단적인 성향을 띠고 보도하는 것은 안되겠죠.

현재 우리나라 언론은 이점에 대해서 어느정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최근 일련의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조금 그 위험한 경계를 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언론의 선진의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허유민(한양컴공 2) : 언론의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입장으로서의 보도를 막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저는 언론보도에 대해 감시하고 중재할 수 있는 범사회적, 범시민적 단체나 모임등을 만들어 감독 및 평가하는 것도 좋은 사회적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김재혁(상명국통 3) : 네, 학우분들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입장,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의 언론을 위한 생각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려 합니다. 선진 언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던 이병혜 KBS 이사께서는 정치권력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위하여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을 제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학우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필수(광운법학 3) : 저는 공영방송인 KBS 가 수신료 인상을 해도 정치적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KBS 를 운영하는 시스템적 측면에서 정치적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재 KBS 의 임원진이나 사장 등의 인선 역시도 정부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입장 속에서 단순히 재정적인 독립만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할 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공영방송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BBC 같은 경우는 사장 인선 시 범정부, 범사회적, 범시민적인 사장 인선 추천제도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러한 방식을 쉽게 접목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전관예우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른나라의 체제를 접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공영방송에 맞는 독립적인 공영언론의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MBC 나 SBS 등의 비공영 방송사들은 수신료 징수가 아닌 독자적인 이윤 추구를 통해 언론사별로 각자의 입장에 맞는 언론보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KBS 가 수신료 인상을 통해 재정적,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컨대 다양한 케이블 채널과 인터넷 매체등의 발달로 인해 볼거리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KBS 를 시청하는 일반 대중들이 그리 많지 않을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은 공평치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수신료에 대해선 아직까지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진 요즘, 공영방송의 수신율은?
(출처:한국선진화포럼)

허유민(한양컴공 2) : 저는 김필수 학우분과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공영방송의 존재목적은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대중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 속에서 KBS 가 양질의 정보를 과연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수신료가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의 수신료가 무려 80 년대에 채택된 액수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마시는 차 한 잔 값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인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수신료를 가지고 공영방송인 KBS 에 대해 양질의 정보와 컨텐츠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김필수 학우분의 말씀대로 공영방송인 KBS 가 정부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누구나 다 이해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말그대로 일반 타 방송사들처럼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는 아니기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신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가고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는 이 시점에 언론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인 KBS 가 주도적으로 한류를 더욱 확산시키고 코리아를 전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질의 컨텐츠 생산을 위한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출처: 한국선진화포럼)

일본의 NHK 방송은 전세계 어디를 가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BBC 도 마찬가지이고요. 세계인들은 이렇게 방송, 언론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통해서도 그나라의 국력을 알 수 있습니다. KBS 도 전세계적으로 송출이 되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국력에 걸맞는 수신료 현실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의견은 김필수 학우분의 말씀대로 KBS 를 운영하는 시스템적 측면에서 초당파, 범시민적인 측면에서 함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꾸려나간다면 KBS 나름대로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을 띄고 올바른 선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승규(상명일고 3) : 저의 의견은 김필수 학우분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저도 공영방송인 KBS 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KBS 가 잘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비롯하여 프로그램 역시도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KBS 를 시청하는 일반 대중들도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이 시점에 세금내기도 빠듯한데, 수신료까지도 인상시켜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공영방송인 KBS 부터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KBS 의 달라져야 할 모습은 앞에서 두 학우분께서 잘 말씀해주셨기에 그걸로 설명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네요.

김재혁(상명국통 3) : 네,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을 맺고 모임을 매듭짓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수 학우분께서는 공영방송인 KBS 가 개혁되지 않은 이상 수신료 인상은 선진 언론의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네요.

허유민 학우께서는 전세계에 널리 퍼져나가는 한류와 코리아 브랜드를 위해서 또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라도 수신료 인상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인상을 할 필요가 충분해 보이지만, KBS 운영 시스템적으로는 개혁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해주셨네요.

마지막 한승규 학우께서도 역시 김필수 학우분처럼 공영방송으로서 KBS 의 더 나은 모습을 먼저 보여준 이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네요.

오늘 이렇게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언론의 역할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을 지칭할 때 제 2 의 권력이라고도 칭하기도 하죠.



이러한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이 선진화 될 때 선진시민의식도 함께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연구모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⑦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다영, 류덕환, 송준행, 김근우, 배지현, 김재희

김재희(과기 영어 3): 이렇게 저희 서울과학기술대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과학기술대 3 차 연구모임,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 월 월례토론회를 바탕으로 제가 선택한 주제는 '정직'과 언론입니다. 연구모임을 하는 당일 11 월 14 일인 오늘 연예인들의 도박과 관련된 SNS 를 보셨나요?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이 말하기를 이 사항이 특정 정치적 상황을 가리기 위한 권력의 조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SNS 는 언론이 권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연일 도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주장하는 다양한 사진, 동영상 등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 국민 특히나 많은 청년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날의 청년들은 언론의 내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의심하죠. 하지만 언론은 많은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 목적입니다. 따라서, 언론에게 가장 중요한 선진시민의식은 '정직'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는 언론의 신뢰도 입니다. 앞서 저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언론을 믿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도 동의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론을 얼마나 신뢰하나요?

류덕환(과기 행정 3): 언론이 경제나 사회면은 비교적 정직하다고 느끼지만, 정치와 관련된 언론은 특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서로 기사 먼저 내보내고 정정기사를 내보내는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학사'의 교과서가 그 사례가 되겠는데요. "교학사'에 '5.16 은 민주항쟁이었고, 5.18 은 폭동이다'라고 써놨다. 이는 친일교과서다.'라며 한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에 대해 신문사측은 고작 한 줄의 정정보도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3 일전 한 언론에서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인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 이렇게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언론은 정확한 확인 없이 먼저 글을 올리고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먼저 들은 것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도를 먼저 해버리면 해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도에 대해 통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신문사도 이익이 아닌 진실 보도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과기 에너지정책): 신뢰도는 사람마다 언론을 접한 경험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문을 주의 깊게 읽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따라서 저 역시 80~90%이상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보는 눈을 가진 전문가 측에서는 그러한 기사를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험에 따라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와 같이 사회문제를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체로 다 믿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준행(과기 컴공 4):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언론이 하는 역할은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진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언론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언론사가 종종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로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선을 앞두고 조중동은 박근혜 후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질문을 배치하고 대답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는 그들이 예상한대로 나올 것입니다. 또 일부 언론은 그러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박근혜 후보가 유력하다는 보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언론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언론을 믿기보다는 제가 필요한 정보를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얻습니다. 또, 그러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지식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신문사의 신문을 읽어보니 내용이 달랐습니다.(출처: 한국선진화포럼)

배지현(과기 산공 2): 저는 학교 중앙도서관을 통해 신문을 학기 내내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경향신문만 좀 보다가 사람들이 보수, 진보 양측의 신문을 같이 읽는 것이 좋다고 하기에 한번 같이 읽어 보았는데요.

똑같은 날짜의 신문 중 중앙일보와 한겨레를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언론사마다 너무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사례가 국방부가 대선에 개입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한겨레에서 대서특필을 하였지만, 중앙일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1 주일, 2 주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보 측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지지하는 자료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수 측 언론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 언론에 대해 많이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측면의 신문만 보다 보면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양측의 언론을 모두 보고 다 알면 좋겠지만 너무나 바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읽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 제 언론에 대한 신뢰는 깨진 상태입니다.

류덕환(과기 행정 3): 저는 얼마 전 들은 강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 강연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신문을 보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유는 교수님께서 쓰신 칼럼이 한 기자에 의해 바뀌어진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 인데, 기자가 잘못 이해하고 이를 3 이나 4 로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신뢰도가 떨어진 데에는 기자들의 잦은 오도와 호도도 그에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과기 에정): 그런데 신문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가를 따지며 그 책임을 기자나 신문사에게 넘기기보다는 독자의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기자가 독자를 생각해서 쓰긴 하지만 독자가 글을 쓰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론은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글이 권력자에 의해 정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자가 어떤 글을 믿어야 할지 고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스스로 많은 정보를 모아서 판단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준행(과기 컴공 4):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언론은 특정 권력을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보도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언론은 특정 생각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입히고 강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대중에게 주고, 그러한 정보를 받아드리는 것은 독자에게 맡겨야지, 재정적인 도움이나 정치적인 도움을 이유로 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합당한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처럼 언론들이 특정 집단들에 의해 휘둘리는 것을 방치한다면 대중이 부정한 특정 권력에 의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이 만들어진 기존의 취지와는 다른 생각이기에 언론이 특정입장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김재희(과기 영어 3): 아시다시피 저는 이 홍보대사를 통해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또 하나의 언론 활동이죠. 그런데 그 칼럼을 쓰다 보면,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를 적절히 취합하여 글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누군가는 조작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여기서 언론이 중립을 지키는가, 한 입장을 대변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선별한 정보가 사실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이라는 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다음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제는 언론이 스스로 정직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와 선진시민의식인 '정직'을 어떻게 퍼트리는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이 정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론이 정직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정직'이 중요한 언론이 '정직'을 국민들에게 퍼트리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례로 뉴데일리의 '거짓말 추방운동'이 있겠죠.

배지현(과기 산공 2): 언론이 스스로 정직해진다는 것이 언론이 fact 를 보도한다는 말씀인가요?

김재희(과기 영어 3): 그렇습니다. 위조하지 않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준행(과기 컴공 3): 이전이랑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독자가 정보를 선별할 수 있으려면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 등으로 올라가야 할 기사를 보도하지 않게 한다거나 포장을 하면 일반 독자들은 그 사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선별을 더 어렵게 합니다.(출처: 한국선진화포럼)

왜냐하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검색 한 번만 해도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정보가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정보인지 찾기도 어렵고, 그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판별하기도 어려운데 독자 스스로 선별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권력들은 특정 글을 보도하라기보다 특정 글을 보도하지 말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포털 사이트들도 정부나 대기업에 관한 기사들을 금방 내린다거나 검색어를 조정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이유로 언론이 권력에게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지현(과기 산공 2): 제가 한 포럼에서 한 신문사 대표 이사분께서 한 일화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분께서 대기업의 비리를 알게 되셨는데 대기업에서 이를 보도하면 광고를 끊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광고비의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신문사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보도하겠냐고 하셨습니다.

송준행(과기 컴공 4): 언론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 대기업이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선정적인 소재를 추구하는 독자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언론은 그러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권력층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읽은 기사에 따르면, 현재 홍보수석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 기자가 그 홍보수석의 눈 밖에 나면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언론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맞는가 싶었습니다.

김재희(과기 영어 3):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독자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끌리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쓸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제가 오늘 선정한 주제도 어떻게 하면 그들의 흥미를 선진시민의식 '정직'으로 돌릴 것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송준행(과기 컴공 3):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언론의 자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3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독립, 둘째는 앞서 언급된 경제적 독립, 마지막으로 기자의 정직성과 도덕성입니다.

이 중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이 아닌 제 3 의 입장에 있는 시민들이 언론이 보다 정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나 개개인의 시민이 후원을 해주면 언론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시민단체가 후원뿐 아니라 감시자의 역할도 하면 그들의 정직성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행정도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후원과 더불어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게 감시하는 거죠.

류덕환(과기행정 3):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이 그 사례가 될 텐데요. 앞서 말씀하신 바처럼 되면 신문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원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실제로 민원을 넣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렇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모두들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대중이 스스로 그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실행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송준행(과기 컴공 3): 물론 이것이 이상적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나서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런 말을 퍼트림으로써 어느 순간 누군가 듣고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우(과기 에정): 또 다른 방법은 '만민공동회'에 기반하여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한국의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이 편파적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토의의 장을 만드는 주체가 언론이 되는 것이죠. 언론은 사람을 주목시키고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의 장을 언론이 만들면 보다 선진시민의식의 확산을 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프랑스와 우리나라 고 3 을 비교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 즉, 우리나라 고 3 은 수능 전 작은 책상에서 공부만 하는 반면 프랑스 수험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카페로 가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직업, 주제를 막론하고 몇 시간씩 토론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사회적 가치나 제대로 된 시민의식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러한 토론을 통해 국민들은 공감할 것이고 이를 위해 언론이 장을 만들어 '정직'을 퍼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류덕환(과기 행정 3): 또, 생각해보니 신문사가 국민들한테 피드백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 투고가 아니라 시민들이 신문의 내용을 피드백하는 방안도 언론 스스로의 정직 함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준행(과기 컴공 3): 사실 언론이 '정직'을 퍼트리기 위해 가장 먼저 본인 스스로 정직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고 이어 시민들의 '정직'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그들이 정직하지 않은 이유는 부도덕한 사람이 성공하는 풍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에 대해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정직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하는 이 상황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정직을 지키면서 성공을 하거나 그에 따른 이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장려하는 캠페인이나 다큐멘터리를 해야 합니다.

배지현(과기 산공 2):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가 빠른 산업화와 빠른 민주화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몇 백 년에 걸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며 자연스럽게 시민의식이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의식은 느려 이 가치들이 충돌하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진시민의식을 퍼트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 그 중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본다'는 인식이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준행(과기 컴공 3): 저 역시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물질만능주의 풍토가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로 인해 선진시민의식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을 특별히 더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윤리나 정직에 관한 수업은 도덕 수업시간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마저도 대부분의 학생이 열심히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체계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희(과기 영어 3): 그럼 우리가 언론과 이를 같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직'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에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송준행(과기 컴공 3): 언론이 도덕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언론이 교육에 미치는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따라서, 언론이 윤리교육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하는 것이죠.

김재희(과기 영어 3): 하지만 언론이 아무리 보도한다고 한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에 매료된 대중이 이를 주의 깊게 볼까요? 언론이 계속해서 보도하더라도 대중이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끊길 것입니다.



언론이 정직교육을 부각시킵니다(출처: 한국선진화포럼

송준행(과기 컴공 3):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수능과 같은 교육 문제입니다. 언론이 대학진학과 맞물려 이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주목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이나 한국사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다루니 실제로 그것이 교육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언론이 '정직'에 관한 내용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더불어 교육부와 같은 정부 측에서도 이에 협조한다면 도덕교육 특히나 '정직'에 관해서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덕환(과기 행정 3): 이와 더불어 기발한 광고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기발한 광고는 특히나 오래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미없다고 느끼는 '윤리'나 '정직'을 재미있고 짧게 자주 언론에서 자주 홍보하면 사람들이 이를 어느 정도 내면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직'과 관련된 TV 공익광고를 만들어서 정부가 이를 광고하는 방송사에게 일정량의 광고료를 제공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활성화시키는 정부와 방송사 스스로의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정직'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송다영(과기 행정 3): 정직한 인물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누군가에 대한 인물평가와 더불어 그 사람이 대표하는 어떤 가치 즉 '정직'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그 효과도 크리라 봅니다.

배지현(과기 산공 2): 납세자 상이나 10 년 무사고 상 같은 상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민들도 언론으로부터 정직이라는 테마로 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사람들의 인식변화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희(과기 영어 3):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모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대체로 언론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지도 못 할뿐더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다른 언론사들의 큰 차이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언론의 여러 모습에서 기인하였는데요.

이러한 언론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언론이 정직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언론 후원이 그 방법으로 제시 되었습니다. 이어 언론이 '정직'을 퍼트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는데요.

먼저,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회, 시민에 의해 피드백 받는 언론, 정직을 위한 윤리교육시간 확대 및 수능에 반영, 광고의 이용, 정직 인물을 위한 프로그램, 정직한 사람을 위한 언론의 상이 제시 되었습니다.

가장 '정직'해야 할 언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이 더 정직해진다면 그들이 퍼트리는 선진시민의식 '정직'은 더 빠르게 전파될 것 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3 차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⑧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방태연(숙명홍광3), 여진솔(숙명홍광3), 김현아(숙명글로벌3)

김혜인(숙명홍광 3): 우선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79 회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선진 시민 의식 전파를 위해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모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가 홍보광고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막연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 정의보다는 캠페인이나 광고를 통한 시민 의식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광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듯이 광고를 통한 시민 의식의 선진화 사례나, 광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홍보광고학과 학생이 아닌 김현아 학우의 경우 방향성에 대한 지침을 주시거나 다른 학우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태연(숙명홍광 3): 저는 고등학생들에게 전공을 알려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서 자주 참가하곤 합니다. 그 때 광고의 역할을 소개해 주기 위해 첨부한 사례가 있는데요.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포대교는 원래 자살률이 가장 높아서 자살 명소 혹은 자살의 다리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제일기획이라는 광고 회사에서 이 다리를 생명의 다리로 바꾸는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다리에 "상심하지 마", "가장 빛나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등 안부를 묻는 문구를 새겨 넣고 사람이 지나가면 그 부분에 빛이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제 광고제에서 수많은 상을 휩쓸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자살 방지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캠페인이 광고의 기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는 단순히 물건을 팔거나 포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혜인(숙명홍광 3): 저도 처음 광고, 캠페인이 어떻게 선진 시민 의식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마포대교의 사례였습니다. 자살 방지 캠페인이기에 엄밀히 말해서 시민 의식의 선진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광고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해 준 사례인 듯 합니다.

김현아(숙명글로벌 3): 저는 공익 광고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시민 의식의 선진화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익 광고는 직접적으로 대중들에게 시민 의식의 선진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TV 는 타 매체보다 접하는 연령층이 다양하고 신뢰성이 높은 편이므로 이를 통해 선진화 메시지를 담은 공익 광고를 제시한다면 효과적으로 시민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을 듯 합니다. 영상 광고이므로 적절한 이미지와 배경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방태연(숙명홍광 3): 저는 김현아 학우와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공익 광고의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TV 에서 타인을 배려해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잠시 후에는 습관처럼 본인이 하던 행동을 답습하게 됩니다.

TV 광고로는 잠시라면 몰라도 근본적인 의식 구조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진화된 시민 의식을 함양하게 하려면 오히려 TV 광고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마포대교의 사례처럼 사람들의 피부로 와닿는 PR, 즉 홍보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전략이라고 해서 단순히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모임도 소통의 장 아닌가요?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선진 시민 의식에 대하여 대중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면 그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더욱 효과적으로 시민 의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인(숙명홍광 3): 두 분께서 '선진 시민 의식'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한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신 듯 합니다. 양비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많은 대중과 접촉할 수 있는 TV 광고와 접촉 대상은 비교적 한정되지만 의식의 변화를 좀더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PR 이 병행된다면 시민 의식의 선진화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진솔(숙명홍광 3): 제가 어릴 때 본 광고 중 '세상을 바꾸는 시간, 하루 1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버스의 부저를 대신 눌러 주는 시간 3 초, 떨어진 물건을 주워 주는 시간 3 초 등이 모여 1 분이 된다는 광고였는데요.

저는 그 광고를 보고 하루에 1 분만 투자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돕는 것이 큰 돈을 기부하거나 하루 종일 봉사 활동을 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방태연 학우의 말처럼, 광고가 단순히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의식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람들에게 제시한다면 TV 광고도 충분히 의식의 선진화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기부 문화의 정착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단순히 기부를 하자는 메시지의 전달이 아니라 "소액 기부" 등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여 사람들에게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행동 양식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 의식을 위한 광고의 역할이 아닐까요?

김혜인(숙명홍광 3):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시민 의식의 선진화를 촉발시킬 뿐 아니라, TV 를 통한 광고의 허점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인 듯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고의 목표 자체가 시민 의식의 선진화인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광고의 메시지 자체는 의식의 선진화와 관련이 없더라도 광고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혹은 광고의 방식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있을까요?

방태연(숙명홍광 3): 윔피 버거(Wimpy Buger) 라는 버거 회사는 버거 위의 깨로 점자를 만들어, 버거가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시각 장애인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15 개의 점자 버거에 대한 이야기는 80 만 명의 시각 장애인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광고는 일반인들에게 시각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줄 뿐 아니라, 광고의 방식 자체가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광고 목표는 자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었지만 시민 의식의 선진화에도 도움을 준 셈입니다.

김현아(숙명글로벌 3): 확실히 위처럼 좋은 방식으로 광고를 하거나 제품을 만들 때 좋은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하는 것(공정무역 커피 등), 판매 수익으로 공익 사업을 벌이는 것 등은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 줄 뿐 아니라 판매 수익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듯 합니다.

여진솔(숙명홍광 3): 아무래도 이렇게 기업이 주관하는 광고들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므로 시민 의식 개선에 전념하기는 힘들겠지만 시민들 의식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욘드라는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동물을 이용한 생체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광고합니다.

이 광고로 인해 동물 실험을 몰랐거나 그에 대해 별 개념이 없던 사람들도 '동물 실험이 나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물 실험을 지양하야 한다는 선진화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류 브랜드 아베크롬비의 경우 뚱뚱한 사람들이 매장에 있으면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라지 사이즈를 만들지 않고, 점원은 잘생긴 백인만을 기용합니다. 이는 대중들이 무의식 중에 '뚱뚱한 것은 아름답지 않고, 백인이 가장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브랜드 도브의 경우 미의 기준은 다양하고 각자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뚱뚱한 모델과 흑인 모델, 마른 모델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윤을 위해 광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사람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혜인(숙명홍광 3): 광고의 메시지가 선진화가 아니더라도 광고의 방식을 통해 선진 시민 의식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듯 합니다. 구체적이고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민 의식 선진화를 위한 광고를 한 가지 구상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진솔(숙명홍광 3): SAVE THE CHILDREN 캠페인처럼 매개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이 캠페인에서는 참여자들이 직접 모자를 떠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선진 의식을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모자와 같은) 매개체를 만든다면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태연(숙명홍광 3): 예전에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린 후, 과연 몇 명이나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지를 통계화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접목하여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 놓이게 한 후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관찰한 후 행동을 교정해 주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뜨린 지갑 안에 배려심을 북돋아 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식으로요.

이것을 미디어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 주면 흥미도 유발하고, 시민 의식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광고가 되지 않을까요?

김혜인(숙명홍광 3):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쪽으로 의견을 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보통 이윤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 광고로도 시민 의식의 선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구체적인 사례와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내 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⑨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신희영, 강은비, 백주아, 송예슬, 안현식

백주아: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언론의 역할. 주제부터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찾을 때 어디서부터 우리 언론에 대한 언급을 시작해야 할지 조금은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언론의 현주소에 대해 한 번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좋은 언론이 되려면 현재 언론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또 그에 따른 효과는 무엇일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언론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지에 대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신희영: 일단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편파적인 보도, 왜곡 보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삼성동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 인터넷 조선일보 기사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관할이 아니어서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박원순 시장의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언급은 인명피해가 사고에 비해 많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인데, 서울시 관할에 관한 언급과 함께 말한 이의 의중을 왜곡하여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바로 삭제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는 당파성에 입각해 각 언론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측의 주장을 왜곡한다거나 비꼬는 식의 보도가 많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은비: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 당시에 3S 정책(Sex, Sport, Screen)을 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적인 곳으로 돌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실제로 자행되는 중요한 사건들은 은폐하기 위해 주로 추문이나 스캔들과 같은 자극적인 기사로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던 에일리 사진 유출이나 연예인 도박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겠죠.

송예슬: 자극적인 기사들과 함께 흥미 위주의 기사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뉴스 기사는 경성 뉴스(Hard news)와 연성 뉴스(Soft news)가 균형이 있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뉴스는 연성 뉴스의 비율이 경성 뉴스의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근본 원인을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무엇보다도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으니 정치적 무관심도 또한 증가하고 이렇다 보니 연성 뉴스만 많아지는 거죠.

인현식: 언론의 본래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언론은 그러한 제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언론이 권력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력이라 함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자본 권력까지 포함합니다. 언론사 역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돈이 있어야 굴러가는 곳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많은 언론사가 생기다 보니 사람들이 기존 언론사를 찾지 않고 인터넷에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언론사는 당연히 경제적인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료와 광고료가 분산되기에 자본을 쥐고 있는 권력자의 횡포에 언론이 어쩔 수 없이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과연 어떤 언론사가 삼성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여 언론사에 입사한 기자들이 기업들에게 광고를 따러 다닌다는 이야기.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백주아: 우리 나라 현재 언론의 문제점과 실태들을 상세하게 조목조목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이라고 하여 육하원칙은 따르지만 사실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은폐하는 언론, 쾌락적 본능만을 자극하며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언론.

부수 경쟁에만 집착하며 재미 흥미만을 제공하는 언론, 권력에 힘없이 휘둘리는 언론.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덕분에 우리 모두 심각한 우리나라의 언론 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지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희영양이 지적해줬던 부분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보도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는 너무나도 기본에만 충실해 있고 조금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언론인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하지만 육하원칙에 말고 그 사건이 발생한 배경은 무엇이고 그 사건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 것일까요? 즉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언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건 그 사건이 일어난 맥락 속에서 사건에 관한 기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당파적인 영향으로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요.

인현식: 부수 경쟁에만 집착하는 언론하니까 아까 빠뜨린 언급이 있었는데 인터넷이요. 정말 웹 상에 수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클릭 한 번이 돈이다 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 희영양에 제시해준 사건 같은 게 발생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수업시간에 기사를 작성하고 기사작성법을 익힐 때 분명 우리는 제목의 중요성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제목을 매력적으로 써야 사람들이 읽을 테니까요. 하지만 많은 인터넷 기사의 대부분은 낚시성을 위한 자극적인 제목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낚시성 뉴스에 실증을 느끼다 보니 이전보다 훨씬 뉴스에 대해 불신감도 커지고 관심도 사라지고 기사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고 그저 제목에만 의존해서 사건을 이해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할 수 없고 편향된 의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송예슬: 웹 상에서는 지우면 그만입니다. 지면 신문이나 방송 영상 같은 경우는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웹 상에서 삭제하면 사라져버리는 '휘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언론들이 이전보다 책임감을 덜 느끼고, 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삭제하면 그만이니까요.

백주아: 네. 웹 기반 시대에서의 언론의 문제점까지 짚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론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니 그렇다면 이제 '좋은 언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언론이 좋은 언론이며 그 언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희영: 제가 생각하는 좋은 언론이란 사람들에게 정보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류해서 전달해주는 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또 한 번 예를 들어보자면,

'국정원 사건 시위 문제'와 관련해서요. 얼마 전 시청 앞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길래 뭐지 하고 들여다 보니 사람들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더군요.

대강만 들었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집에 가서 저희 가정에서 구독하는 중앙일보를 뒤졌습니다만 국정원 사건 시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 권력 기관의 비행만큼 중요한 정보를 왜 다루지 않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이 세계 최고라는 기사들이 중요한 정보일까요? 현재 언론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려고 할 때 불신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 관심 또한 사라지겠죠. 좋은 기사가 우선순위가 매겨져 잘 분리된다면 사람들 또한 기사를 접하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백주아: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언론이 누군가가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저 그것을 전달하는 플랫폼이 되어서는 안될 텐데요. 요즘 언론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해보자면 요즘 언론의 성격은 마치 대변인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사건이 발생했다는 fact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니 드러나는 사실만 전달하고 끝인 거죠. 미국과 한국의 앵커의 역할 차이에서도 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의 앵커들은 대부분 주어진 대본을 읽을 뿐 뉴스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앵커에게 편집권을 줍니다. 미국 NBC 의 간판 앵커 톰 브로커 역시 이 편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뉴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소신이 있게 매길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언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보의 우선순위와 함께 제대로 된,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야 말로 좋은 언론이 될 것이고 좋은 언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면 그 때부터 언론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론은 의제 설정에 선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현식: 궁금한 게 있는데, 앵커의 편집권이라 하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일구 아나운서가 뉴스에서 뉴스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멘트를 첨가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사실 최일구 앵커가 자신의 주관적인 멘트를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걱정스러운 것은 앵커의 영향력이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나운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출했을 때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쉽게 믿어버리고 오해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앵커는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은비: 아니오. 그 부분과는 좀 맥락이 다릅니다. 주관적인 멘트를 사용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전 날 있었던 톱뉴스가 1 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언론에 관한 내용에는 잠시 비껴가는 언급이긴 하지만 저는 플랫폼이 지금 신문 따로 방송 따로 인터넷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 주아 언니가 지적해준 사실과 진실문제에 있어서도 복잡한 언론의 플랫폼 구조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게 되는 것 역시 기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이 플랫폼이 혼란스러운데 문제가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취사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실이 있어도 못보고 지나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겠죠.

백주아: 플랫폼의 문제에 대한 언급 또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기자가 사명감이 부족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은비양은 또 다른 측면에서 진실이 가려지는 이유를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좋은 언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인현식: 좋은 언론이란 감춰져 있는 진실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언론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이 제공되지 못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투명하게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력의 문제 또한 큰 것 같습니다.

좋은 언론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현재 언론계의 좋지 못한 상황을 또 한 번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현재 언론계의 환경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NHK 의 사회부

기자가 약 300 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를 다 합쳐서 300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인력에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진실을 파헤치는 데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서 진실을 제공하려고 해도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제약에 걸려 제대로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예슬: 제가 생각하는 좋은 언론이란 권력, 정치와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좋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상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같은 경우는 국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은비: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도 수신료일 것 같은데요. 수신료를 외국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면 자본 권력에 휘둘림 없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앞에서 현식 오빠가 언급해준 인력 제한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백주아: 좋은 언론이야기를 하다 현재 좋은 언론이 되지 못하는 이유까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할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우리 각자는 현재 언론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민의식을 선도할 수 있을까요?

강은비: 저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인이 되고 싶은데요. 그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다른 힘이 필요할 텐데 그 다른 힘은 바로 시민들에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앵무새가 되어야 한다고 할 지라도 시민들의 앵무새가 되어 일한다면 시민들도 제 개인적인 노력을 믿어줄 것 같고 서로에게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 또한 시민들에게 잘 수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희영: 저는 시민들의 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언론인이 되고 싶습니다. 선진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론의 역할, 처음에 주제를 들었을 때 언론의 영향력과 파급력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았었는데요. 예를 들 수 없이 정말 언론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한다면 그 차후에 따라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언론의 무너진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달되는 메시지 또한 사람들에게 파급력을 가질 것입니다.

송예슬: 저는 사회나 정치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언론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사람들이 흥미 위주나 재미 위주, 자극적인 기사들에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정치든 경제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친근하고 쉽게.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정확히는 언론이 아니지만 옛날에 한 방송 프로그램,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와 같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에 쉽게 편하게 다가가서 중요한 사실과 꼭 필요한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제로 삼고 선진화에 대한 메시지 또한 그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현식: 저는 언론인이 굳은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기관에 입사하게 될 경우 그 회사의 사규나 사훈에 의해 재사회화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신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꽤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진 기자라면 반드시 자신이 처음에 기자가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념을 바탕으로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알리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때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백주아: 저는 사람을 살리는 언론인이 되고 싶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선진화된 시민 의식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진화된 시민이라면 남보다 조금 더 배려하고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각박한 환경 속에서 언론 마저 부수 경쟁이다 클릭 수 경쟁이다 싸우는 마당에 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 또한 답답하고 지겹고 실증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언론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다시 제대로 인식시켜주어야 하는데요. 그 출발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언론, 언론 스스로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끔 언론과 시민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언론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의 경쟁구도, 권력 구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언론 그들만의 소신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1시 방향 본인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근,김가연,전형진,김재민,이동건,정재은,고승찬,강승모

이승주(경영 4): 안녕하세요 학교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언론들이 사건 맥락과 관계 없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5:5 로 중립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선진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입니다.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언론이란 우리 사회에 필요한 agenda setting 을 하여 국민들이 몰랐던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선진시민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남양유업 사태에서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갑을 관계에 대한 보도가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여 결국 기존의 종속적 하청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강승모(신방 4): 언론이 여러 가지 보도를 하면서 그 중에 시민들이 접하여 선진시민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언론이 말하셨던 agenda setter 로써 기능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주(경영 4):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언론이 agenda setter 말고도 다른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강승모(신방 4): 경우에 따라서는 중립보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건 맥락을 덮지 말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문제 환기적 보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신 것 같은데 그 사건 맥락을 언론이 이해 관계에 얽매인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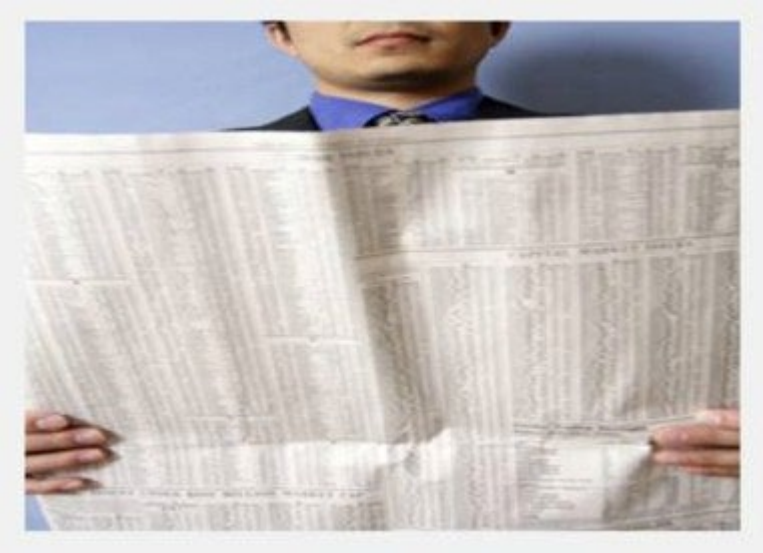
이동건(경영 3): 그리고 언론들이 보수적인 TV 조선 같은 방송국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되지 않은 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은(경영 2): 저는 언론사들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들 중립보도만 한다면 언론사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언론사 별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놔두고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경영 3):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을 광고주로 두고 있는 보수 언론사들이 자금 면에서 풍족하고, 그 돈으로 인터넷 포탈에 자신들 기사를 일면에 싣는 행위들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보수 언론사들의 기사에 노출될 것 같습니다.

이승주(경영 4): 그럼 언론이 선진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중립보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남은 분들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연(경영 3):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남양유업 사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하청기업에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는 상식적으로 좋지 않은 사건 맥락 구도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중립보도를 하지 않고 맥락에 맞게 보도하기 위해 남양 유업의 변호의 목소리들은 사전 필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승찬(경영 4): 주변에 신문 기자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정의감이 투철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 기자가 되었을 때 언론사는 중립보도만 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생긴다면 그들의 정의감에 기반한 사건보도가 억압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진 사회라면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전형진(경영 2): 다른 분들 의견을 듣다 보니 언론은 A 여야 한다 B 여야 한다 등 일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중립 방향이든 사건 맥락에 따라 재구성하는 방법이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김재민(경영 2):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취재원 보호제도가 철저한 것을 보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에 중립만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시민 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사람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국민들도 보수, 진보, 중도 성향이 있으므로 각자의 소신에 맞게 선진시민의식을 해석하고 이들끼리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회 아닌가요?

이승주(경영 4): 그래서 언론들도 각자 성향에 맞는 보도를 하도록 정부차원에서 간섭하지 않고 놔두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재민(경영 2): 아까 한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폰을 많이 받는 보수언론들이 대중들에게 파급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악화되는 일만 없다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이승주(경영 4): 네 여러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언론이 선진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중립유지와 맥락에 따른 소신 보도 두 가지 증 어떤 쪽이 바람직할 지에 대해 대부분 소신보도를 하게 놔두되, 파급력이 클 수 있는 보수언론이 압도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사건의 맥락을 스스로 판단하여 소신껏 보도를 하게 놔둘 경우 대기업 스폰 자금으로 보도 경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보수언론들이 목소리가 다른 언론들을 잠식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강승모(신방 4): 예전에 미디어법이 통과하여 진보단체 인사들이 반발하고 큰 사회적 이슈로 미디어법이 거론되었을 때 진보인사 유시민씨가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조중동의 편파적 목소리를 받아칠 수 있는 공영방송의 힘이 작아진다고 문제제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TV 조선 시청률이 저조한 것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에 정부 지원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사회 이해세력의 한 쪽 의견에 휘둘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동건(경영 3): 보수언론들이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뇌 당할지 모른다고 문제 제기하신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은 취업 난에 자기 할 일에 신경쓰기 바빠서 시사, 뉴스에 신경을 끄고 사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전 오히려 이런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정재은(경영 2): 보통 보수 언론이 대기업 편파적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대기업 육성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가져다 줘서 궁극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요즘 추세는 국민들 지식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져서 이런 말에 넘어가기보다 오히려 대기업, 정부, 사회 기득권 세력을 무조건 자기들만 아는 사회 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언론들이 국민들을 세뇌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고 봐요.

이정근(경영 3): 보수언론들과 목소리가 달라서 잠식당할 염려가 있다고 말하신 언론사들을 찾는다면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진보성향의 언론매체들이 있는데요.

기득권층에서는 자신들을 적으로 취급하는 이런 존재들을 싫어하겠지만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러한 진보성향 언론매체들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게임 구도에서 바라보았을 때 진보 언론매체들이 잠식당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드물 것이라고 봅니다.

김가연(경영 3):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성향 언론매체들의 국민 지지도가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수 언론매체들이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여러 매체들에 자기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점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뢰하지를 않는 것이죠.

이승주(경영 4): 대부분 보수언론이 국민들을 세뇌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적절하게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공존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언론들이 각자 성향에 맞춰서 agenda setting 을 하는 것이 선진시민의식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나머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승찬(경영 4): 의제란 언론사가 생각하기에 의미가 있는 메시지인데 그 판단 척도가 언론사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성향의 언론사가 발안한 의제인지 고려하면서 해당 내용이 진정으로 선진사회 구축에 도움이 되는지 판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형진(경영 2): 다양한 성향의 언론사들이 같은 시사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의 사고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활발해질 것이고 거기서 오가는 내용들의 질도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재민(경영 2): 선진사회를 건설적 토론이 활발한 사회라고 정의했을 때 다양한 성향의 언론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각자 소신껏 의제를 제시하도록 하여 시민들끼리 그 의제들 중 어떤 것을 선진시민의식 고취의 목적으로 활용할 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승주(경영 4): 네 이상으로 언론이 선진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어떤 보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언론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고 유익한 의견 교류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⑪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희철(경영3), 박동민(경영3), 최승호(경영3)

임성현(경희경영 3): 지금부터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이라고 하면 준법정신, 질서확립, 배려 등의 여러 요소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중 오늘 토론을 나눠 볼 선진시민의식은 배려입니다.

지난 60 년 간 우리나라의 GDP 나 수출실적 등 경제적인 지표에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식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사회의 배려 덕목을 점수로 메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올바른 댓글 문화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희철(경희경영 3): 학점으로 따진다면 C 에 가까운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주위에만 둘러보아도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 또한 배려와 같은 덕목보다는 대학진학에 목을 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배려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통화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모습 등은 단순히 배려만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010 년쯤에 우리학교에서도 일명 '경희대 폐륜녀'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모두 다 알다시피 매일 아침 일찍 나오셔서 학교를 치워주시고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에게 온갖 폭언을 일삼은 학생을 보면서 정말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최승효(경희경영 3):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배려가 부족한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 배려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 등을 보면 폐륜과 같은 사건들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는 극소수의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건들을 저지르는 사람을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점수로 매기자면 100 점 만점에 80 점을 주고 싶습니다.

박동민(경희경영 3): 저도 우리 사회가 배려가 없는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80 점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일단 토론을 하고 있는 우리만 봐도 배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주위에 배려가 없는 사람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산 적이 없어 다른 국가들의 배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예의가 바르고 배려심이 깊은 국가임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배려가 사라진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배려는 찾아보기 쉽다고 봅니다. 단지 사회가 변한 만큼 배려에 대한 척도가 변화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자유가 온라인상 배려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을까?

임성현(경희경영 3): 저 또한 우리 사회가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회가 바뀌어서 배려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들이 주로 접하는 인터넷 상에서는 배려가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라는 익명의 공간을 통해 상호비방은 물론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마녀사냥 등의 행위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배려 의식에 대해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댓글을 자주 보고 달 수 있는 인터넷 기사, 즉 인터넷 언론매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각자의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박동민(경희경영 3): 아무래도 인터넷 언론매체가 배려와 같은 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너무도 자극적이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읽게 하기 위한 기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기사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기사를 읽는 사람들 또한 자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경상도·전라도 사람간에 적대심이 없는데 요즘 홍어, 통구이 등의 용어로 지역들을 비하하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댓글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늘어간다는 점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식, 즉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인터넷 언론매체들은 우리 국민들의 배려 의식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효(경희경영 3): 저도 인터넷 댓글이 우리 국민들의 배려의식을 무너뜨린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오프라인 공간과는 달리 온라인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댓글을 남기게 만들어놓은 포털사이트나 언론매체들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댓글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는 언론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익명성이라는 자유를 악용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댓글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인터넷을 지금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댓글이라는 것도 잘 몰랐었지만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인터넷 기사보다는 댓글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러한 댓글을 잘 판단해서 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효(경희경영 3): 얼마 전에 '니가 없는 세상'이라는 웹툰을 보았습니다. 간략히 이야기 해드리자면 지구에 운석이 떨어져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너'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바이러스 입니다.

단순히 '너'라는 존재만 모르게 되었지만 이 사회는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던 도중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의문을 느끼며 방송 중에 나가버리고 학생들 또한 수업시간에 나가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웹툰에서는 결말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즉 상대방에게 배려가 없는 세상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온라인 상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과학 ·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온라인 세상과 밀접하게 살아가야 할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온라인도 하나의 사회인 만큼 오프라인과 같은 규제와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현(경희경영 3): 의견을 종합해보니 인터넷 댓글이 시민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도 오프라인과는 다르지만 하나의 사회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에서도 온라인에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가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인 만큼 인터넷 언론매체에서도 올바른 온라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지, 지금 언론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희철(경희경영 3): 언론 혼자서 올바른 온라인 문화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지금과 같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기사를 자주 낸다면 배려 없는 온라인 세상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의 역할은 전제조건으로서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언론매체, 오프라인 언론매체를 떠나서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재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의 댓글 문화가 더럽혀졌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배려하지 않는 모습까지 왔다고 봅니다.

언론이 좀 더 정직하고 신뢰가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특종만 잡으려고 추측성 기사나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일이 많아 우리 국민들의 신뢰성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뢰성을 찾고 공정한 보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댓글에서도 배려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동민(경희경영 3): 올해 여름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단지 특종을 잡기 위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니까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우리 언론이 지금 기사를 내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실제로 언론이 저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의식을 떠나서 언론이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기사만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기사는 잘 쓰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서 돈이 될만한 기사만 쓰는 언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언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언론에게 공정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언론 스스로 깨닫고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변화한 만큼 국민들의 인식 또한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고 온라인상에서의 배려 문화도 정착되리라 봅니다.

최승효(경희경영 3): 언론 스스로가 자극적이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는 것과 동시에 인터넷 댓글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댓글을 쓰는 자유를 줬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댓글을 통해 매일 싸우고 대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댓글 관리에도 책임의식을 갖고 너무 심한 댓글의 경우 글쓴이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저 댓글을 지켜보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성현(경희경영 3): 저 또한 우리 언론이 배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선진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했으면 합니다. 오늘 3 차 연구모임도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⑫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이요한(철학4), 신동철(정치행정3)
김광래(재무금융4), 한정호(재무금융4)

김광래(재무금융 4): 제 79 차 월례토론회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도덕적 문제를 각종 언론에서 비판한다면 시민들의 도덕이 개선될 것인가 아니면 여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늘어날 것인가 대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정호 학우님부터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정호(재무금융 4):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덕정신을 기초로 한 선진시민의식이 필수적입니다. 언론의 역할을 시민들의 알 권리에 입각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 의식의 정착을 이끄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토론 주제처럼 무조건 적인 비판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TV 를 통한 언론매체는 신뢰를 많이 잃어 대중들을 비판하는 것이 더 역효과를 불러올 것 같고요. 막무가내식 SNS 를 통한 전파와 비난도 전혀 효과를 볼 것 같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비판을 하되 새마을 운동처럼 시민들이 다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같이 병행한다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요한(철학 4): 저도 한정호 학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막무가내 언론의 비난은 오히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비판적으로 언론을 바라보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비난과 물타기 보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해 봤습니다. 최근 무한도전에서 세종대왕님의 한글과 관련된 소재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책이나 뉴스를 잘 보지 않는 층에게 역사교육이 되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도덕적 질서와 시민의식의 문제점을 테마로 방송이 나가면 아주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래(재무금융 4): 무한도전 같은 인기프로그램을 활용하자는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만 예능을 잘 보지 않는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에게는 뉴스나 신문 등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이요한(철학과 4):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땅한 해결책 없이 딱딱하게 비난하고 보도되기보다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면 뉴스나 신문을 보지 않는 집단들에게는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동철(정치행정 3): 두분 의견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가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인데 주제에 어긋날 것 같지만 좋은 해외의 정책 사례가 있어서 자료를 찾아와 봤습니다. 제가 조사한 국가는 청렴국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건국 초기에 공공장소에서의 시민 예절부터 녹지 조성, 건물 관리까지 국가가 직접 간섭을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좁은 국토를 완벽한 정원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면 당연히 국민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독한 공공질서 유지 정책입니다. 거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면 500 싱가포르 달러(한화로 약 35 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담배는 금연 캠페인의 일환에서 면세가 없습니다. 무단 횡단을 해도,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지 않아도 벌금을 내구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했지만 습관이 되어 싱가포르는 더욱 쾌적해졌습니다.

언론의 역할하고는 주제가 엇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부터 청결 정치와 또는 직접 개입하는 제도, 무거운 벌금 등을 언론에서 보도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막무가내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그 해결책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김광래(재무금융 4): 네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일 전 대전 충남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학생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정우 학우님과 이요한 학우님처럼 충분한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비판은 오히려 역효과를 본다는 주장에 동의하구요 예능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싱가포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혁신과 무거운 벌금을 무는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 정부의 언론통제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정부 최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된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MB 의 멘토 '방통대군'이라는 불리면서 정권의 언론통제를 주도해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부터 현 NLL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끝임 없이 언론통제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논점에 대해 한정호 학우님부터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정호(재무금융 4): 한국정부추론 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때 기말시험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말시험이 '한국정부'에 대한 자유 주제에다가 오픈 테스트 형식이라 '정부의 언론통제'라는 주제를 정해서 각종 신문기사와 참고문헌 속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쓴 것입니다.

한국정부추론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정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고 한국정부의 행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하던 자료를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전 정부보다 늘어났다는 응답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의 3 배에 이르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가 이전 정부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25.1%,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9.5%,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29.4%로 조사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언론 역사는 언론통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언론은 유신독재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으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연행하고 고문하는 등 언론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언론기관통폐합으로 1000 명이 넘는 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또 언론사의 등록을 문화공보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언론기본법으로 언론통제의 기초 마련하고, 일상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문화공보부 산하에 홍보조정실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특보인 김인규씨를 KBS 사장에 앉힌 것과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업자에 조선·중앙·동아 일보 등 친여보수언론을 선정한 것은 언론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과거 정부들의 언론통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정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언론을 강제로 통, 폐합을 한다거나 정부에 반하는 기사 내용들은 암묵적으로 삭제 및 탄압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제약했습니다.

이렇듯 정권이 변화함에 따라 정권의 성격에 따라 언론의 입장도 달라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편향적인 언론의 행보 속에 정부마저도 자신의 정당성을 보호해주고 옹호해주는 언론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중립적인 뉴스 전달이나 기사를 보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송사 내에서 친정부적인 인사를 채용하는 점은 암묵적으로 언론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김광래(재무금융 4): 한정호 학우님의 말씀과 시험자료는 몰랐던 지식을 알게 해주어 감사드리지만 토론 주제와는 너무 동떨어지는 주제이며,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론은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며, 그 효과에 대해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요한(철학과 4): 저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제하고 잘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정치권력만으로는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주요 언론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은 무력으로 언론사를 위협하거나,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언론사의 요직에 앉히거나, 언론사에 정부 차원의 다양한 혜택을 주어 회유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되고 시민의식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인 방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다 교묘한 방법, 예컨대 권력의 유지를 위해 밝혀져서는 안 될 공공문제 관련 정보들을 '국익' 또는 '공익'의 이름으로 기밀로 분류해 언론에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정보를 선택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언론에 제공하는 '정보관리'를 행하는 등 보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방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를 보이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본권력을 끌어들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언론과 자본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언론 고유의 가치인 공공성뿐만 아니라 언론의 경제성, 산업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언론과 자본 사이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본권력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김광래(재무금융 4): 이요한 학우님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즉, 자본권력을 통해 언론을 통제한다면 역시 정치권력을 통한 통제처럼 시민사회의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요한(철학 4): 자본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를 교묘하게 묵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자유언론의 개념과 언론의 민주적 역할을 규정하는 설득력 있는 시각 중 하나로 평가 받는 '자유주의적 언론관'입니다.

자유주의적 언론관은, 언론의 가장 핵심적인 민주적 역할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정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대한 어떤 공적 규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언론은 철저히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는 비판하면서도, 그보다 더 심하게 언론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시장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적 언론관은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즉, 정치권력의 언론통제를 비판함으로써 상당히 정의로운 인상과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자본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에 대해서는 탈규제의 논리로 효과적으로 묵인함으로써 새로운 언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유주의 언론관에 대한 비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언론은 상품이 아니며, 언론에 대해서만은 시장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즉 공공성과 같은 언론 고유의 가치를 보존해야 함을 강조하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대의 언론들이 이미 그들이 보존해야 한다고 말하는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몹시 원시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로서,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언론통제의 새로운 주체로 자본권력이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두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동철(정치행정학 3): 저도 이요한 학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본력이 없으면 어떠한 언론도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본권력을 통한 언론통제는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간편한 것이기도 합니다.

언론활동이 유지되기 위해서 충분한 자본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이 아무리 자본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외치더라도, 그들이 자본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영향력 있는 언론을 소유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자본이 없는 사람은 언론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영향력 있는 언론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자본가들입니다.

김광래(재무금융 4): 신동철 학우님께 죄송하지만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 주신 점은 감사 드리지만 내용이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장악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쪽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정호(재무금융 4): 제가 최근 사건들을 인용해 언론장악의 심각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 년 7 월 13 일 밤 서울광장에서 2 만 명이 넘는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인파가 모였는데, 공영방송에서는 이 소식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 월 6 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도 방송 3 사는 거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KBS 가 〈뉴스 9〉에서 '단신'으로 보도한 게 전부입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1 만여 명이 참석했지만 MBC 와 SBS 는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신으로 다룬 KBS 도 이날 집회를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이 아닌 '진보 · 보수단체의 갈등'으로 보도했습니다. 물론 보도의 선택권은 방송국에 있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보도 행태임에 KBS, MBC, SBS 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간이나 접근성의 부족함보다는 사안의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 YTN 에서 국정원의 개입으로 '국정원 댓글관련 보도'가 갑자기 중단됐고, MBC 에서는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보도가 통째로 편집돼 아예 방송이 되지 않는 사건 등 방송의 통제와 공정성의 상실에 대한 논란이 사회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불공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히려 〈시사매거진 2580〉의 '국정원에 무슨 일이' 편의 방송보류에 항의해 피켓시위를 한 기자 4 명에게 MBC 가 근신 15 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KBS 임창건 보도본부장은 보도국 기자 전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사실상 국정원 개입 주장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기호에 촉각을 맞추고, 언론의 자긍심을 부정한 이런 행태는 당연히 신뢰를 잃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013 년 8 월 16 일 media today 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가 실시한 언론사의 신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를 묻는 질문에 한겨레신문이 21.9%로 1 위, 경향신문이 14.9%로 2 위, KBS 가 13.5%로 3 위를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4.8%, 중앙일보는 2.1%, 동아일보는 1.1%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MBC 는 신문보다 떨어지는 0.5%의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한국의 언론에 대한 세계의 시선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공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조사대상 179 개국 가운데 한국은 2008 년 47 위였고, 2013 년에는 50 위로 후퇴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서 내놓은 '2013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정부 권력 비판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원래 언론이란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와 옳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역할이지만 현재 한국의 언론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늬만 언론'으로 추락한 데에는 정부의 끊임없는 언론 장악 시도가 일조를 했는데, 대표적인 수단이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이요한(철학 4): 제가 보태자면 정부 취임 이후에도 공영방송들은 사회적 공분을 사거나 검증이 필요한 쟁점들을 외면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직접 통제 방식이 자기 사람으로 경영권을 장악하여 통제하는 간접방식으로 바뀌면서 톡톡히 효과를 나타낸 셈입니다.

간접방식은 과거와는 달리 공영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신보도지침'으로 정부의 의중을 알아서 움직여주는 현재 방송사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운영진의 정권에 대한 충성은 공영방송을 왜곡시켰고, 과거에 직접 언론 통제에서 '저항 대상은 정부'로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방송 왜곡의 원인이 방송사 내부의 분란으로 나타나게 해서, 저항할 대상이 모호하게 되어 진흙탕 싸움의 양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진흙탕 싸움에 만족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sns 등이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새로운 언론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집권자가 아닌 위탁 운영자임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왜곡된 공영방송의 재정립을 위해 통제의 유혹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인사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 방송이 살아남거나 배제되는 시장원리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경영과 취재 및 보도의 분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방송사에 정착시키면 됩니다.

김광래(재무금융 4): 다른 분들 언론장악에 대해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 없으신지요? 신동철 학우님

신동철(정치행정 4): 지금의 공영방송은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운동경기에 관심을 두고 정치에 눈 돌리지 말라고 프로축구 프로야구를 출범시킨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과정을 언론인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공영방송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바른 공영방송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김광래(재무금융 4): 음.. 언론장악에 대한 나쁜 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은 뉴스 등을 통해 수없이 봐왔던 내용입니다. 남은 토론시간은 해결방안만 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하자면 저희 선진화포럼 학우님들의 칼럼에서 또한 제가 칼럼을 작성하면서 본 내용인데요 말을 해보자면 일단 언론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언론을 보는 시민들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종 뉴스나 기사들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을 건 믿되 중립적인 자세로 비판적인 사고로 뉴스를 보자 이겁니다.
또한 요즘에는 SNS 가 대세인데요. 물론 SNS 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SNS 를 잘만 사용할 수 있다면 언론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우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정치행정학 4): 네 저도 김광래 학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중립적으로 보는 자세뿐만 아니라 방송사나 여러 언론매체들이 예산을 신경 쓰지 않고 권력에 대한 용감한 매체가 되는 개편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래(재무금융 4): 더 이상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신가요? 네 오늘은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요 핵심 주제보다 조금 엇나간 자료들이 많아서 다른 주제를 갖고 토론을 했던 점은 아쉬웠지만 시민의식 고찰과 언론장악에 대해 토론하면서 서로 지식을 공유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⑬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민정(동아국무 3): 귀한 시간 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선진국대열에 합류했지만, 우리의 시민의식은 아직 선진국가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민의식부터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원(동아국무 4): 제가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이란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생각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우리 사회는 공동체의식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다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품앗이, 두레 등 다같이 협력하는 사회였으나 최근에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많이 결여되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반에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시민의식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사회에서의 우리라는 공동체의 마음가짐을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진영(동아국무 3): 저는 공동체의식보다 우선 개인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스스로 '5 대 준법정신', '10 대 실천운동' 과 같이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지킨다면 한 명, 한 명이 모여 공동체적으로 발산되고 선진시민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호(동아국무 4): 앞에서 이야기한 학우님들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저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선진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대체로 남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저는 작년에 일본에서 6 개월 정도 생활했습니다. 일본의 시민들은 개인의 행동을 주변의 시선보다는 스스로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시선보다 스스로의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재성(동아국무 4): 시민의식은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 한 명이 바뀐다고 사회가 바뀔까? 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 하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선진시민의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지훈(동아국무 4): 동일한 도시에서, 시민들이 같은 신념과 통념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선진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불꽃축제 개최가 되면 부산에서 부산에 사는 시민들이 불꽃축제를 잘 마치는 것이 공통된 가치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튀거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동기(동아국무 3): 선진시민의식 말 그대로 생활수준이 높아진 만큼 사람들의 태도나 의식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 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우리사회는 놀라울 만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지만 그에 따른 선진시민의식은 향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은 독립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김민정(동아국무 3): 네 학우님들이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학우님도 있었고, 개인의 행동변화가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는 학우님도 계셨습니다.

발전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진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부산 광안리에서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밤하늘에 불꽃들이 수놓았지만, 바가지요금, 무질서, 교통혼잡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학우님들은 부산의 시민의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9회 부산불꽃축제, 축제관람 후 광안리 곳곳에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즐비해 있다. (출처: CIVIC 뉴스)

이지훈(동아국무 4): 민주화와 산업화의 역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의식수준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낸 성과는 많지만 부작용 또한 많습니다. 그 부작용의 예가 세계적인 축제나,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했을 때, 보여지는 결여된 시민의식입니다.

부산은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전쟁과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발전되었지만, 아직 시민의식부분은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보시면 산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형성된 집들과 마을입니다.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타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지키려는 의식이 아직 내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니 이제는 의식수준도 향상되어 시민의식도 더 발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재성(동아국무 4): 네 이번에 열린 불꽃 축제 그 뒷면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신문기사에서 저도 보았습니다.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부산지역의 주민들 입니다. 하지만 무질서와 교통혼잡의 문제는 부산을 떠나 우리사회를 대변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 해변에서 나오는 많은 쓰레기들은 부산지역의 사람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인한 것입니다. 축제나 관광지에서는 그 지역의 시민의식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원(동아국무 4): 부산지역의 시민의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특별하거나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가지 문제의 경우 어느 관광지에서나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광지에서도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질서나, 교통혼잡 등의 문제는 부산과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주호(동아국무 4): 저는 부산에서 26 년을 산 부산토박이 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조금 접해보고 싶습니다. 부산은 해안을 끼고 있고, 많은 왜구의 침입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자기가족의 목숨을 지키는 것을 예로부터 중시 여겼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러한 의식들이 베어있다 보니, 운전을 할 때도 자신이 안 다치기 위해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산의 교통사고율은 전국 1 위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불안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내륙도시에 비해 시민의식이 조금 더 결여되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요즘은 부산사람이라고 부산에만 살지도 않고 KTX 로 서울과 부산을 3 시간 만에 갈 수 있어 1 일 생활권이라 합니다. 예전에 부산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요소가 많았지만 이제는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융합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더 발전된 시민의식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재성(동아국무 4): 저는 이주호 학우의 말에 동의합니다. 부산지역은 경남지방에서 소득이 제일 낮다고 들었습니다. 대체로 선진시민의식은 소득과 비례해서 상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타인과 사회에 대한 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기(동아국무 3): 저는 울산출신입니다. 울산과 부산을 비교했을 때, 시민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불꽃 축제는 규모가 크다 보니, 일반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대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민정(동아국무 3): 네 학우님들이 생각하는 부산의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부산의 역사와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시민의식이 결정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부산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과 시민의식이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거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책을 읽읍시다', '양심 냉장고' 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민들은 한 권의 책이라도 사서 읽으려고 노력하고, 정지선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언론의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뢰성 없는 정보가 많아지고, 언론이 제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님들이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주호(동아국무 4): 우선 언론이 돈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다면, 광고를 통한 수익이 따라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지금의 언론들은 좋은 프로그램보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만 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허재성(동아국무 4): 최근 수신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수익구조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수신료 인상으로 한 방송사라도 정치권이나 다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다면 수신료를 올리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한 방송사라도 공정한 보도에 힘쓴다면, 다른 방송사들도 공정한 보도에 힘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론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회원(동아국무 3): 저는 이주호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치권이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패치의 경우 후원금으로 보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올해 공정한 보도 부분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후원금으로만 이루어지는 언론이면 돈이 많지도 않을 것인데, 공정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기(동아국무 3): 무엇보다 언론은 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나쁜 정보를 주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올바르면 자신이 가려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언론은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언론이 존재 합니다. 한 가지 사건에 관한 수많은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기사도 개인이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관적인 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도 있습니다.

허재성(동아국무 4): 언론은 사실에 기초한 공정한 보도와 더불어, 다양한 캠페인과 선진시민의식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오래 살더라' 라는 말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황진영(동아국무 3): 저는 페이스북이나 SNS 에 올라와 있는 안 좋은 시민의식의 사례들을 볼 때, 저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신뢰성이 없는 자료가 퍼지는 것은 안 좋지만 사진과, 동영상이 첨부된 시민의식 사례들은 저를 되돌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방송된 '칭찬합시다' 프로그램에서는 시민들을 칭찬하고 있다.
(출처:MBC)

이동기(동아국무 3): 저는 이경규와 같은 방송인이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합시다" 방송 당시 우리는 이경규가 지켜보고 있을까 봐 더 좋은 일들을 하고,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SNS 나 언론에서는 너무 안 좋은 시민의식 사례들만 올라와 부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이것보다는 낫지 하는 마음으로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민의식 사례들을 더 많이 보도하여 나도 저 보도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주호(동아국무 4):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인의 인성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제대로 잡힌 언론인들의 보도가 시민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운대 불법 주정차 문제를 빅데이터를 통해 개선한 해운대 구청
(출처:MBC 뉴스)

황진영(동아국무 3): 제가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빅데이터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해운대 구청에서 주정차위반 빅데이터를 조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여, 주정차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과 지역을 분석하고, 그 부분에 집중관리를 하여 주정차 문제를 줄였습니다.

언론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해주고 시민의식이 제일 안 지켜지는 부분을 분석하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면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시민의식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김민정(동아국무 3):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학우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진시민의식이 중요한 만큼 학우님들의 선진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학우님들이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과, 부산지역의 시민의식, 또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참여 해주신 동아대학교 학우님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⑭ 부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승찬(동아경영3), 장철환(동아경영1), 김수창(부산신방 4), 도경철(동아경영1)

김수창 (부산신방 4): 다들 학업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들 제가 보내드린 발제문과 각종 자료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언론의 역할' 그 중에서도 '공익광고'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익광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 5 공화국 시기인 1981 년에 '방송광고향상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미디어 랩이 설립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2013 년 현재는 KOBACO, 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미디어 랩으로서 공익광고 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익 광고가 흘러온 역사를 보면 1980 년대에는 '국민 희망' 등과 같은 제목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주제와 자원을 절약하고 아끼자는 주제, 그리고 88 서울올림픽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친절 하라는 주제, 산아 제한 정책 등을 주제로 시행되었습니다.

1990 년대에는 개그우먼 이경실 씨를 모델로 등장시킨 절약 광고, 음식물 쓰레기 광고, 15 대 대선을 맞아 공명 선거, IMF 사태 속에서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등의 주제로 공익광고가 시행되었습니다. 2000 년대에는 생활 에티켓(쩍벌남 등), 가족간의 대화를 많이 하자, 외국인 노동자 차별 문제를 주제로 한 광고를 시행하였습니다.

2010 년대에 들면서 인터넷, 모바일이 전국적으로 대중화되면서 네티켓, 불법 복제 방지, 악성 댓글 방지와 관련된 주제로 한 공익 광고가 시행되었는데 여기까지 다들 잘 이해하셨겠지요?

도경철 (동아경영 1): 예, 잘 이해했습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이렇듯 공익광고는 30 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시대별로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공익광고를 시행하여 왔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 하시기에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앞으로는 공익광고가 어떤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철환 (동아경영 1): 저 또한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0 년대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예절을 주제로 한 광고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빈도와 양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지금껏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흘러온 것을 보면 2000 년대부터 급속도로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제 1 의 인터넷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환경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이 우리 생활, 심지어는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금보다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중 또한 늘어나면서 인터넷 범죄도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 제가 볼 때는 에티켓을 활용하는 광고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에티켓'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 시행 빈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된 만큼 에티켓 또한 중요한 공익광고 주제

김승찬 (동아경영 3): 우선 사회자님께서 말씀해주신 한국방송광고공사 설립 이후에 진행된 '대한민국 공익광고의 기조'에 대해 잘 들었고, 우리나라 공익광고의 주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사회자님께서 정말 중요하지만 한 가지 말씀해주시지 않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효' 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입니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던 우리나라는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것이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부모님을 모시려 하는 가정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들 노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꺼려하는 추세이고 독거노인 비중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부모가 빨리 돌아가시라고 밥을 일부러 굶기는 등의 노인 학대라는 반인륜적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요.

시대가 발전한 만큼 한국 또한 더욱 더 시민의식이 선진국에 걸맞게 변화해야 하는데 '효' 를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갈수록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효'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공익광고의 주제가 바로 '출산 장려 정책'을 홍보하는 공익광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만큼 후에 경제 활동 인구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노인 부양비의 부담을 감소하여 아까도 제가 언급한 '노부모 방치' 나 '노인 학대' 와 같은 그러한 범죄 또한 발생할 확률이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 믿습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저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행되었던 광고 주제인 '예절'을 주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정말 이러한 주제로 시행되는 공익광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서도 보았듯이 지하철에서 남들에게 피해 줄 정도로 동영상을 튼다든지, 아니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해서 시끄럽다고 시비 붙어서 싸움이 붙는다든지 등과 같은 사건 사고가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중 예절'을 주제로 한 공익 광고를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많이 시행된 주제인 만큼 이 광고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각인되기 쉽도록 좀 더 강조를 많이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광고를 그냥 보는 순간만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요. (웃음)

솔직히 사람이 공감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상 생활', 우리가 실제로 겪는 것을 배경으로 만들면 공감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은 것으로 말이지요.

김수창 (부산신방 4):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경철 (동아경영 1): 만약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것을 주제로 한다면은 길 가다가 쓰레기를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듯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잘 담아내는 것도 있죠.

김승찬 (동아경영 3):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예로 들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재수없게 껌을 밟았습니다. 껌 떼느라고 막 고생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지요.

도경철 (동아경영 1): 네 맞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당해 본 것이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저질러 본 것을 주제로 공익광고를 만든다면 지금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가지게끔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승찬 (동아경영 3): 광고 문구를 예로 들자면 '무심코 버린 껌이 나이키 운동화를 망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웃음)

김수창 (부산신방 4): 와우! 카피가 장난 아니네요. (웃음)

김승찬 (동아경영 3): 그런데 이런 공익광고를 대중들이 많이 보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고위 계층에 속한 분들이 많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실제로 제가 '공익 광고' 라는 말을 막연히 많이 들어 봤는데 취지가 무엇인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수창 (부산신방 4): 공익광고가 말 그대로 광고를 통해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것이 곧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시킨다는 취지로 만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승찬 (동아경영 3): 또,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목적도 있지요.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한 어떤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가난하고 못 사는 절대 빈곤의 국가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지금 세계

10 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은 광고 또한 예전부터 많이 봐 온지라 잘 알고 있습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사회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아도 되겠습니까?

김수창 (부산신방 4):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삭막하고 이기적이고 성과주의의 경쟁 체제 속에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남을 무참히 짓밟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각기 다른 주제로 공익광고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공익광고가 온전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철환 (동아경영 1): 좀 더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인터넷 네티켓에 대해 광고를 한다면 '당신이 무심코 남긴 말이 다른 사람을 파멸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도경철 (동아경영 1): 자극적인 것도 좋지만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실질적으로 해 본 것이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탁월하다고 봅니다.

김승찬 (동아경영 3): 공감도 있어야 하고 효과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주위의 시선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뭔가 재미가 있으면서 충격을 주는 신선한 소재를 가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장철환 학우께서 말씀해주신 자극적인 소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철환 (동아경영 1):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악성 댓글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 뒷부분에 악성 댓글을 통해 자살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성 댓글로 자살한 연예인들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서 가족들이 오열하는 장면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악성 댓글이 정말로 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것 또한 공익 광고의 소재로써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티켓' 공익광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악성 댓글'

도경철 (동아경영 1):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익 광고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김수창 (부산신방 4): 지자체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주최해서 만듭니다. 또, 우리가 보는 공익광고 중에서는 시민 공익광고 공모전 입상작이 방영되는 경우도 있지요.

김승찬 (동아경영 3): 우선 공익광고는 너무 길어도 안 됩니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짧으면서 강렬한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김승찬 학우께서는 공익광고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승찬 (동아경영 3): 사람들이 요즘 유투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투브를 통해서 공익 광고를 방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도 공익광고가 노출되게끔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승찬 (동아경영 3):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라면 인터넷의 '웹툰' 처럼 시리즈별로 스토리 있게 만들어서 공익 광고를 연재물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회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실험을 공익 광고에 담아서 보다 시청자 참여적인 공익 광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이 참여하는 만큼 공익광고가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실험'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식채널 e 에서 본 적이 있는데 다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1961 년도에 미국 예일대에 재직 중이던 사회심리학자 '스텐리 밀그램'이 '권위에 대한 복종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밀그램의 실험이라면 참가자로 하여금 15V 에서 450V 까지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한 실험을 말씀하시나요?

도경철 (동아경영 1):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기 안에서 전기 충격으로 비명을 지르는 사람은 실제로는 전기가 통하지도 않는데 막 비명을 질러댔죠. (웃음)

장철환 (동아경영 1): 그런데 보상 때문에 참가자들 중 어쩔 수 없이 450V 까지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실험과 같은 것이 사람들의 공감을 잘 이끌어낼 수도 있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빙성을 얻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김승찬 (동아경영 3): 역시 자기가 평소에 모르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자기 모습을 몰랐는데 '헉 내가 이랬다니!'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김수창 (부산신방 4): 말씀하신대로 자기 모습을 깨닫게 하려면 어떤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승찬 (동아경영 3): 도경철 학우께서 말씀해주신 '실험' 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몰래카메라'와 같은 방식으로 공익광고를 만드는 것 또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BS 다큐프라임' 에서 그런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요. 물론 너무 심하게 하면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광고를 하면서 동시에 광고를 하는 주체, 즉, 정부에서 공익 광고를 주최한다고 하면은 정부가 공익 광고에 담은 주제나 내용 등을 실제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네 그렇습니다. 공익광고를 시행하는 주체 또한 모범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실험'이지요. (웃음)

김승찬 (동아경영 4):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명 스타들을 끌어들여서 프로그램 제작할 때 공익 광고에 나온 것을 모토로 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도경철 (동아경영 1): 예능 프로에 공익광고를 도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승찬 (동아경영 3): 그렇습니다. 해학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공익 광고를 볼 수 있게끔 하면서도 사람들이 경종을 울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요.

도경철 (동아경영 1):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공익 광고도 단편적으로만 한다면 선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대충 넘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MBC 무한도전'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너무 유희를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익 광고를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익 광고를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이것은 당연히 옳은 행동이고 이것은 당연히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인식하고는 있지요. 왜냐면 사람들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공익광고는 일부 진부한 내용보다는 좀 더 'KBS 위기탈출 넘버원'과 같이 사람들이 모르던 것을 깨우쳐 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안전 공익광고를 시행한다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안전하니 우리 모두 이렇게 합시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이나 공감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사그라들기 십상이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새로운 정보를 던져 주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끔, 진부한 것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공익광고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선진화 연구모임이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의 의견 또한 나날이 발전되는 것 같아서 진행자인 저 또한 선진화 홍보대사로서 크나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이 시민이 선진화된, 진정한 선진국을 이룩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다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상 2013 년 11 월 12 일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⑮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한결(일본학과 4): 세 번째 연구모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한국선진화 포럼 10 월 월례토론회에서 진행되었던 '선진화 사회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언론의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낚시기사나 허위기사 혹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언론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미란(일본학과 4): 콘텐츠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안철수 국회의원의 '라면 값'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안철수 국회의원이 연 간담회의 목적은 경제약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었는데요.

농심 대리점주인의 라면 값에 대한 물음은 올바른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대리점의 입장을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라면 값을 알지 못하는 안철수의원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비방하기 시작하였고, 정작 간담회의 목적이었던 경제약자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윤지(정치외교 4): 지미란 학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의 FBI 가 전 국민을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스노든 사건입니다.

당시의 스노든은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범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스노든의 폭로의 본질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국가간의 감시와 도청에 대해서만 기삿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유정(교육학과 4): 저는 역시 언론의 '낚시성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목은 독자들이 기사를 어림짐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XX 연예인 알고 보니..충격'와 같이 '알고 보니..충격' 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작 기사를 보면 제목과는 다른 내용의 기사가 많습니다. 기사를 보지 않고 제목만 보는 이용자들에게는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박윤지(정치외교 4): 저는 추측성 기사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의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더 자극적인 기사로 독자를 끌어 모으려는 언론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대처하려는 모습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언론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무슨무슨 기자단'이 많이 생겼는데요. SNS 국민 기자단, 대학생 기자단 등 이러한 활동들이 언론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을까요?

박유정(교육학과 4):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기자단은 한국소비자원의 '컨슈머 기자단'이었습니다. 최근 '블랙 컨슈머'라고 해서 대가를 바라고 일부러 제품의 안 좋은 인상, 소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소비자의 시선을 잡기 위하여 허위 내용을 만듭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정보들이 많은데, 컨슈머 기자단의 경우, 일단 한국 소비자원이라는 믿을만한 공공기관의 기자단인 만큼 신뢰도가 있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컨슈머 기자단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지미란(일본학과 4): 박유정 학생이 이야기한 이유에서 최근 많은 기업에서 기자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악영향으로 이용되어 자사의 제품을 과장하여 기사화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혹시 지미란 학생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지미란(일본학과 4):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모임을 함께 한 강원대학교 일본학과 4학년 지미란, 정치외교학과4 박윤지 학생

박윤지(정치외교 4): 한 온라인 신문의 홈페이지에는 시민이 기자가 되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독자들이 볼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기자'는 언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며, 언론인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시민에 의한 기자단은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사를 작성하거나, 언론에 관한 윤리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모임에서 일본학과가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언론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조사를 부탁드렸는데요 자유롭게 조사한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미란(일본학과 4): 우리나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언론을 감독하는 중앙기구가 있지만, 일본에는 이러한 기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박윤지(정치외교 4):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미란(일본학과 4): 2 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언론은 국가에 의해 언론 통제를 경험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후, 언론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그만큼 '표현의 자유'를 다른 가치보다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윤지(정치외교 4): 언론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구가 없다면 언론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전부 신문사나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건가요?

지미란(일본학과 4): 2000 년대 국가가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의 취재 활동에 제재를 가하려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모든 신문사들은 언론의 통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고, 신문사들은 내부에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감시 위원회를 만듭니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와인권위원회’, 마이니치신문의 ‘열린신문위원회’, 교토통신의 ‘독자와인권위원회’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각 위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언론을 감독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지미란(일본학과 4): 아사히신문의 ‘보도와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관련 불만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또한 신문의 기사로 인한 피해사항이 접수되면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편집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 이것이 침해로 여겨진다고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사안에 관하여 신문에 기사화합니다.

박유정(교육학과 4): 신문의 기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언론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사들이 ‘알 권리’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연구모임을 통해 많은 의견을 이야기 해준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4학년 박유정 학생

김한결(일본학과 4): 제가 언론의 자유에 관한 칼럼을 쓰면서 찾은 내용인데, 탈북자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던 중에 방송에 나온 탈북자 가족의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탈북자 부모의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탈북자 부부는 사회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2 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미란(일본학과 4): ‘니시닛뽄신문’이라고 하는 일본 규슈 지역의 대표적인 신문은 월례회의의 내용을 회의 후 2~3 일 내에 특집 기사로 상세하게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알리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위원회의 의견을 자세하게 알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부분도 우리나라 언론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사는 단지 좋은 인식과 좋은 이미지만을 위해서 언론사가 잘못한 점을 숨기거나, 밝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의 진정한 알 권리는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기자나 언론사 스스로가 본인들이 지켜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아닐까요?

박윤지(정치외교 4): 저의 생각도 언론고시를 위한 딱 한 번의 공부가 아닌, 현직 기자들과 언론사 담당까지 언론의 중요성이나, 언론으로 인해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이나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정(교육학과 4): 저는 지미란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언론사가 일본의 자세를 전부 배웠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가장 먼저 해결해 주려는 태도를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일본을 가리켜 '먼 나라 이웃나라' 라는 말이 새삼 공감이 가네요.

오늘의 연구모임은 지금의 언론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나에 대해서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건의 본질은 왜곡하고, 자극적인 기사만 내려는 언론사, 또한 독자의 정확한 판단을 막는 낚시성 기사들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아도 언론사가 자신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언론의식을 의한 정기적인 교육연수. 그리고 언론으로 인한 발생한 피해자에 관한 언론사의 태도 등, 배워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였는데 미리 조사해주시고,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⑯ 울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최해정(경제4), 정주아(법4), 차은지(법4), 정혜진(경찰3), 최정은(정외3)

최정은(정외 3): 벌써 3 번째 연구모임이네요. 원래 3 차 연구모임부터는 서울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포럼교수님께서 울산 대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의 토론을 통해 울산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제 79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번 월례토론회에 대한 제 칼럼은 이미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다 읽어 보셨을 텐데요.

이번 칼럼은 아까도 TV 프로그램이야기가 나왔을 때 얘기했었던 '인간의 조건'을 인용하여 흥미를 끌 수 있는 칼럼을 써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논의 해 보고 싶은 주제 또한 우리가 자주 접하는 TV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을 해볼 생각이에요.

언론은 선진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인데요. 하지만 요새 언론은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이윤추구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 아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과의 토론을 통해 선진시민을 위한 언론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은지(법 4): 선진시민의식이라는 말은 연구모임을 통해서 참 많이 듣고 언급하게 되는 것 같네요. 최정은 학우님의 칼럼은 잘 읽어보았는데요. 선진시민의식과 언론과의 관련성에 대해 얘기해보기 전에 현재 언론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정은(정외 3): 그렇다면 쉽게 접해보기 위해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혜진(경찰 3): 솔직히 과거의 언론도 그렇고 현재의 언론도 그렇고 공영방송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에게 언론이 공적인 영향을 주는 매체로서의 인식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 졌고요.

최정은(정외 3):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정혜진(경찰 3): 쉽게 말해서 요즘 사람들에게 언론은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을 잡기에만 급급한 언론의 모습이 전부라는 거죠. 언론이 공영방송이든 케이블방송이든 신문이든 뭐든, 언론의 세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은지(법 4): 맞아요. TV 방송만 하더라도 유익한 프로그램보다는 낯뜨겁고 그저 억지웃음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막장드라마라는 말이 있듯이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의 혼을 쏙 빼놓는다고 할까요?

뭐, 언론이 그러한 추세로 가는 것이 꼭 언론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미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고 웬만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힘든 것도 사실이니까요. 우리 같은 대학생들도 조금만 딱딱한 내용이면 TV 채널을 돌리기 일쑤이죠.

정주아(법 4): 차은지 학우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언론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국민들이 관심이 그러한 추세로 가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언론의 역할이 미비하고 부적절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언론의 힘을 무시할 순 없어요. 요새는 언론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취할 수 있고 언론의 바른 역할의 부재가 아쉬울 뿐이지,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최정은(정외 3): 그렇죠. 그렇다면 정주아 학우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국민들의 현실태를 바로 잡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건가요?

정주아(법 4): 음, 그러니까 제 말은 국민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언론이 그런 콘텐츠를 위주로 방송을 만들잖아요. 여기에서 언론의 역할이 잘못되었단 것이죠. 언론의 힘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식과 유행을 변화시키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국민들의 추세를 언론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도전은 하지 않고 그저 국민들 입맛에 맞춘 프로그램만 제작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언론은 그러한 존재로 밖에 인식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해정(경제 4): 네, 정주아 학우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국민들도 자극적인 내용을 자꾸 접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더 과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언론이 끊어야죠.

요새 TV 트랜드를 보면 조금씩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정은 학우님의 칼럼에서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으셨더라고 요. 저는 요새 '아빠 어디가?'와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이 프로그램들도 TV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여운 아이들의 엉뚱한 행동을 보는 재미와 더불어 제 어릴 때의 모습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요새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가족 간의 정이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청자들 또한 가족들간의 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 또 예의범절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부모님을 대한 모습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차은지(법 4): 아, 츄블리! 저도 '슈퍼맨이 돌아왔다' 를 매주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나도 저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행 다니고 시간 보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해요.

최정은(정외 3): 그러고 보니 '인간의 조건',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처럼 그저 자극적인 소재를 통한 프로그램이 아닌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네요. 저도 칼럼을 쓰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이 현재보다 과거에 선진시민의식을 확립시키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았어요.

최해정(경제 4): 과거에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최정은(정외 3): 아, 먼저 이제 선진시민의식과 언론 간의 관계에 대한 토의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선진시민의식, 연구모임에서 한 번씩은 언급되는 단어인 것 같죠? 선진화 포럼이라서 그런가봐요. 아무튼 선진시민의식이라고 하면 배려, 정직, 준법정신과 같은 사회적 자본인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생각이 든 것이 과거 프로그램 중에서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이경규씨가 나와서 정차 선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냉장고를 주고 하던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어요.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준법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죠. 다들 기억나세요?

정혜진(경찰 3): 아 네! 기억나요. 냉장고가 간다 였나? 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지켜보다가 상품을 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저도 생각 난 것이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도 있어요. 그 때가 초등학생 때였나 그랬을 텐데, 한 달에 한 권씩 지정도서도 정해주고.

정말 과거에도 선진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네요.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걸 왜 없어졌을까요. 아쉽네요. 오히려 지금 시대수준에 맞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텐데.

최정은(정외 3): 네, 국민들의 시선을 좀 더 유익한 곳으로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지고 각박해져 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방법은 국민들 정서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력을 주진 못하죠. 따라서 국민들을 언론의 힘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방송도 이윤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시청률에 민감한 것도 사실이에요. 따라서 언론의 책임의 무게는 더해진다고 봐야겠죠.

시청률을 무시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선진시민의식 구축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이것 말고도 선진시민의식 구축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요?

최해정(경제 4): 음, 언론이 국민들의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역할을 할 때에는, 지금 상태로서 가장 중요시 보아야 할 것은 역시 신뢰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정은(정외 3):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포럼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접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든지 바로 잡기 위해선 항상 신뢰라는 항목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 만큼, 한국사회에서 신뢰라는 덕목이 결여되어 발생하는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인성문제도 그렇고 저번 연구모임에서는 복지 문제에서도 신뢰도 결여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을 정도로요.

신뢰라는 것 또한 선진시민의식의 덕목 중 하나인데 신뢰가 없는 언론이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한다라는 것이 모순적인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최해정(경제 4): 언론은 TV 방송만 있는 게 아니라 신문도 있는데 특히 요즘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진짜 기자는 아무나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시간으로 보도되다 보니 몇 분 사이로 말이 바뀌기도 하고, 뉴스인데도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고.

정주아(법 4): 맞아요. 특히 연예뉴스는 더더욱 좀 심한 것 같아요. 요새 대학생들도 취업준비를 위해 신문을 자주 보려고 하잖아요. 저도 요즘 들어 자주 읽거든요. 그런데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무리 신문이 각자의 경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극과 극인 보도를 하니까 제 생각까지 지배되어 버리는 것 같고, 내용에 대해 제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고.

최해정(경제 4): 그렇게 편협적인 기사를 보도하니까 언론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최정은(정외 3): 그러니까 학우님들 말씀은 TV 프로그램을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재미와 더불어 유익한 면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시민의식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역할은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건데요. 다른 분들께서는 어떠세요?

차은지(법 4):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선진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언론이 노력한다고 해도, 언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이상 언론의 역할에 대해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진시민의식은 더욱 떨어질게 분명해요.

따라서, '이런 것이 진정한 언론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온 것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 신문은 소수의 중앙지가 독점하고 있다 (출처:한국선진화포럼)

정혜진(경찰 3): 우리나라 언론, 음 그러니까 신문사가 너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는 중앙지보다 지방지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조중동같이 소수의 거대 신문이 거의 모든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지방지가 발달한 나라이다 (출처:한국선진화포럼)

그런데 프랑스나 유럽같이 중앙지 독점이 아닌 지방지가 많이 생겨난다면 국민들이 다양한 성향을 접하게 되면서 편향적인 보도에 익숙해 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소수 독점언론사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권력과 자본의 결탁 또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방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한 독점권력 또한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선진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언론의 역할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최정은(정외 3): 네! 처음 주제가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전개하였는데 하다가 보니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가게 되었네요. 오늘은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었는데요.

언론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아닌 감성을 이끌어 내고 재미와 유익성까지 겸비하여 선진시민의식 구축을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나아가 진정으로 선진시민의식 구축을 위해서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연구모임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네요. 오늘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구모임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여러분의 의견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화 과제 21:

선진안전의식,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제 75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김민희(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안전불감증이란, “난 괜찮겠지”, “난 안전해” 와 같이 자신만은 위험으로부터 예외일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를 하여 위험을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7 년 12 월에 실시한 국민 안전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75%가바로 이러한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고 위험에 미리미리대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안전교육의 근본은 ‘어린이안전교육’에서 출발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꾸준히받은 사람만이 항상 ‘안전’에 대해 ‘불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한국의 어린이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선진국에 비래 3~5 배 이상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높은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와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이 매우 부족하고, 안전한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며,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단속 역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교육만 잘 실시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사고가 7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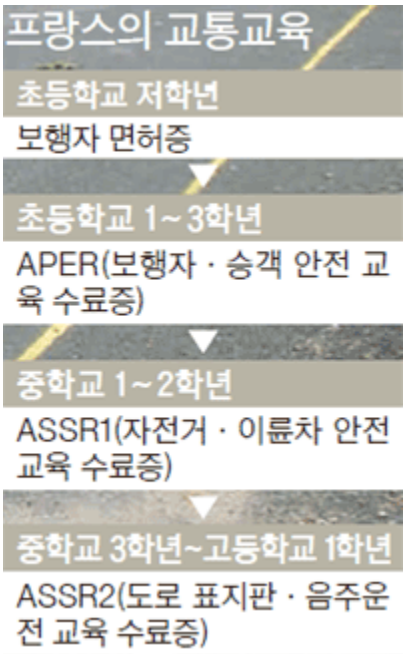
일본이나 여러 유럽국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안전교육에 대한 높은 흥미와 참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안전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참여도와 흥미는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교육은 ‘의무’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미국이나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실제 사고 사례중심의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잘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이 법적 의무화가 아닌 권장 사항에 불과하며 지극히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펼쳐줄 때 어린이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투자에만 급급하여 안전교육에는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시설과 단속 및 규제, 그리고 교육이 적절히 혼재된 정책이 실행되어야만 하는데, 이중에서 ‘교육’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장 확실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인 것이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안전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려면 재미있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여러 유럽국가의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안전교육의 선진 사례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 예로, 프랑스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교통 안정교육 증명서(APER)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불러일으키 고적극 교육에 참여할 방안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기에 아주 적절한 제도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 프랑스의 교통교육 [출처 : 한국 교통 안전 실천 네트워크]

또한 최고의 교통 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은 '안전교육은 3 세부터'라는구호 아래 머리가 깨이는 최초 시기인 3 세부터 각 지역별로 결성된 Safe Kids Club 에 가입하여 부모와 함께 실제 사례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웨덴의 초등학교에서는 일반교사가 매 학년 20 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사회, 체육, 과학 등 관련교과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사들은 대학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끔은 지역 교육담당 경찰관도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굉장히 절실해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안전교육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50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과목에서 실제 체험위주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습교육은 학교 운동장에 도로모형을 만들어놓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법부터 시작하며, 운전자와 눈맞추기 교육, 스쿨버스 승하차 사고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통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하루 빨리 학교 정규과목에 안전교육을 포함하여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는 어릴 때부터의 교육에서부터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어린이 안전교육이 법적 의무화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 안전교육으로 하나되는 세계 [출처 : 구글 이미지]

② 김상훈(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1987 년 10 월의 싸늘한 어느 날, 한 고급 호텔의 연회장에는 월스트리트의 저명한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있었다. 미국 최고의 알루미늄 회사인 알코아(Alcoa)에 찾아온 위기를 타개해줄 신임 CEO 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단정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몸짓이 인상적인 중년의 사내.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곧 어두워졌다. 곧 알코아를 전 방위적으로 지휘하게 될 이 사내가 내건 첫 기업 목표는 시장 점유율 확대도, 원가 절감도 아닌, '사고율 제로(ZERO)'였다.

얼핏 엉뚱해 보이기까지 한 이 신임 CEO 는 훗날 부시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폴 오닐로, 그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알코아의 거의 모든 공장에서 일주일에 한 건 이상 발생하곤 했던 높은 사고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놀라운 건 사고율이 낮아짐과 동시에 알코아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사실이었다. 폴 오닐이 CEO 자리에서 물러난 2000 년에 알코아의 시가 총액은 그가 취임하기 전보다 5 배나 증가했다. 알코아의 사례는 최근 산업재해로 신문 곳곳을 채우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온다. 잇따라 발생한 안전 사고의 원인에는 안전 수칙을 가볍게 여기는 안전 불감증도 무시할 순 없지만 이와 더불어 '빨리 빨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 설비와 장비 미비 및 감독 소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 국민적인 비난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안전 사고로 발생하는 손실은 단순히 계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수치 그 이상이다. 단기적인 효율성 향상 노력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이다.

비단 기업 내 안전 사고 뿐만이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도 당장의 편의, 나 하나면 괜찮을 거라는 개인의 이기심 등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되려 후천적 장애, 더 나아가 죽음과 같이 단순히 돈으로는 절대 메울 수 없는 영구적인 비용을 안게 된다.

다시 말해 빈번한 안전 사고의 원인에는 이기심의 잘못된 발현과 건전한 시민의식의 결여, 그리고 개인의 근시안적인 비용-효익 분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용-효익 분석 측면에서 접근하는 안전 사고의 원인은 논의할 가치가 있는 문제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왜 하면 안 되는지,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와 같이 예방의 이유와 사고의 결과를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도덕적 당위성에만 기댄다. 이는 단지 학생의 이해보다는 무조건적인 암기만을 강요하는 현 주입식 교육의 연장선이다.

폴 오닐은 알코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 사고가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안전사고는 노조와 회사 간 소통 부재의 원인이었고, 생산 공정의 비효율성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및 품질의 문제였으며, 직원들의 나태와 안이함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따라서 그에게 안전 사고 예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방 비용이 미래의 효익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에서 이익이었다. 이렇듯 도덕적 당위성을 근거로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넘어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는 공유이익 창출(CSV : Creating Social Value)로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폴 오닐은 사고투성이 알코아를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

내가 알코아의 사례를 통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마저도 암기 만을 강요하는 현 주입식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당사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지 도덕적 당위성에만 의존하는 예방 교육은 명분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도덕적 원칙 외의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다.

『자유론』, 『정의론』과 같은 위대한 고전의 설명이 도덕을 더욱 완벽히 만들어 주듯이 예방 교육 또한 단지 무미건조한 원칙이 아닌, 피교육자를 이해시키고 공감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비용-효익 시각에서 접근하는 예방 교육은 안전 원칙의 논거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예방 교육을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둘째,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의 안전 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폴 오닐은 근로자의 안전이 곧 기업의 지속가능성임을 알아챔으로써 알코아가 처한 위기를 타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기업 사고를 살펴보면 법에서 요하는 안전 설비 및 장비, 감독의 미비는 물론 사고 또한 숨기려 하다가 오히려 늑장 대응이라는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알코아 사례를 충분히 명심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은 곧 근로자의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을 가져오며 이는 조직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 더 나아가 존경 받는 기업에서 비롯되는 고객 충성(Customer Loyalty)의 확대와 훌륭한 직원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숙지하는 안전 원칙이 개인의 효익, 가족의 안녕, 더 나아가 사회의 행복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다시 말해 안전 의식은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넘어 타인과 사회를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전 의식 숙지는 곧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각 개인은 자신이 사회를 바꾸는 시민인지, 아직 노예로서의 시민 상태에 있는 건 아닌지를 충분히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와 핵 안보 정상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정도로 세계의 책임 있는 주요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전 의식에 관해서는 책임이 부재하다. 특히 10 년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안전 의식은 그때보다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세계에 경제와 민주주의의 기적을 선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제는 훌륭한 시민의식으로서 세계를 감탄하게 만들 차례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선진 안전 의식에서 비롯된다.

③ 김소은(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한민국은 인터넷 보급률 세계 1 위, 세계시장 1 등 품목 121 개, G20 국가정상회의 개최국, 세계 15 위 경제대국 등으로 높은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의식의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만큼의 안전의식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10 만 명 당 약 9.7 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무려 미국의 2.8 배, 일본의 4.4 배, 영국의 19.4 배 라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직접비용 손실액은 연간 32 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11 월 OECD 에서 발표한 국제교통사고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교통사고는 자동차 1 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2.2 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 1.6 명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치는 현재 대한민국이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반증해 줍니다.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국민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교육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고, 그보다 먼저 어린아이 때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일찌감치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학교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교육의 주요 장소로 활용하도록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과정에는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또,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05 년 강풍으로 인한 전복사고로 5 명이 사망했던 우에츠선과 2011 년 동일본대지진의 쓰나미로 인해 쓸려간 열차 등을 보존하여 안전교육에 활용하여 보다 실제감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안전교육은 대부분 자습시간으로 활용되거나, 학교수준의 교재 또는 교구가 거의 없는 까닭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게다가 안전교육의 방식과 과정에 대한 지침 또한 부재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측에서 준비된 안전교육시간이 명목상의 안전교육일 뿐, 진지한 자세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입시교육 위주로 치우친 교육제도와 특히, 체계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알맞은 교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르칠 교사가 있어야 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할 시간이 있어야만 그것을 수준별 · 단계별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통교육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때는 보행자로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배우고, 중학생이 되면 자전거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도로표지판과 같은 교통법에 대해 배워 학생들의 나이대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전교육이 수준별· 단계별로 되어있지 않아, 고등학생에게 초등학생 수준의 내용을 가르쳐 학생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용 면에서 많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런 학생들이 자라 산업현장에 가게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실시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이, 부재한 교육으로 인해 10 년, 20 년 뒤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사고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안전불감증 탈출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의무교육기간 동안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안전교육 현실은 학교별로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기간 동안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의 안전교육으로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대로 안전교육의 수준을 나누어 교육을 진행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안전교육이 제도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시절의 안전교육을 의무로 하고 있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안전교육이 제도와 함께 묶여 안전교육 자체가 더욱 더 필수적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난 현장을 직접 보고 그것을 체험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 태안기름 유출 사건 등과 같은 재난현장을 보면서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현장을 재현하여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체험학습을 체계화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최근 신문보도에서 안전사고를 부르는 위험 요소는 의식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둘째가 제도이며 그 다음이 시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앞으로의 선진화 과정에서 안전성을 갖춘 국민의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필수화하고, 이를 생활화하는 국민 의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④ 김유나(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얼마 전 SNS 에 성범죄에 노출될 뻔했다며 한 남성이 자기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오려 했다는 글이 개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노출되는 수가 잦아지고 성범죄율 또한 계속 증가하면서 미디어의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물론 자극적인 인터넷 기사에 하루걸러 등장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쉽게 성범죄에 관한 컨텐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중파 TV 에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조금만 채널을 돌리면 자극적인 내용은 물론 선정적이기 까지 한 방송들이 여과 없이 나오고 있고 청소년들은 인터넷기사만 클릭해도 양 옆으로 무수하게 쏟아지는 음란물 광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지난 몇 년간은 청소년들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스마트폰 음란물을 아무런 제재없이 볼 수 있어서 한창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또한 2011 년 한국콘텐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와의 관계성 분석'에서는 충북 7 개 고교 재학생 1537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매일 2 시간 이상 음란물을 접한 학생(33 명) 중 15 명(45.5%)이 이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폭력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고 음란물 주인공처럼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본 64 명 중 19 명은 실제로 성폭력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자극적인 미디어들만이 성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일까요? 이런 미디어를 규제하고 차단하는 제도적인 보완만으로 성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데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이 밖에도 자극적인 미디어가 범람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 범죄자의 개인적 심리 문제, 범죄를 대하는 사회 분위기 등의 원인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얽혀있는 원인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해결책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2 시 이후에 미성년자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는 '셧다운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아청법'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만 시행했을 뿐 범죄자 개인의 심리 문제나 사회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 사회적으로 범죄를 매도하는 분위기와 같은 의식조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조두순 사건’만 하더라도 제일 처음 기사화된 것은 피해자의 실명인 ‘나영이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욱 시선을 받는 사회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야만 돌아갈 수 있듯 성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먼저 필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일본과 같이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초청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에 학년별로 학생들의 고민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기본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후에 아이들에게 사회적 도덕성을 강조하고 ‘안전불감증; 나는 범죄를 피해가겠지’라는 의식에서 벗어나고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막연히 범죄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이 아닌 실제로 성범죄자의 대다수가 지인임을 나타내는 통계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난자와 정자의 만남’과 같은 이야기식 성교육보다 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꾸준히 해야합니다.

강릉에서는 주부들이 직접 주부인형극단을 조직하여 ‘찾아가는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아동 눈높이에 맞춘 성범죄 예방교육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범람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미디어 속에서 올바르게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범죄를 대하는 올바른 윤리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국가 주도 하에 범죄자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범죄자 주거지의 일정범위 내의 주민들과 미디어에 알려 범죄에 대한 시민 사회 내의 비판과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노력을 통해 사회 스스로가 범죄를 처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점진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위의 방안이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는 이웃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미디어에서 자극적인 내용과 선정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누구나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일본의 성범죄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학교에서 한 주에 한 시간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외부강사의 초청강의 등의 교육을 통해 사회적 도덕성을 강조하고, 학교에 학년별로 상담교사 배치, 범죄자들을 TV 뉴스나 신문에 인적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웃집 주민들에게 알리며 출소를 한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매도 당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역내 초등학교에서 여자 아동들의 나체 하반신을 비디오로 찍는 등의 악질 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히로시마 지방재판소가 유기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30 년형을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조두순사건’의 조두순보다 2 배 이상 많은 형입니다. 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굳이 제도적 보완을 엄격하게 하고 강화된 규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범죄율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범죄율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민 사회 스스로가 국가의 큰 도움 없이 범죄를 내몰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조성되어 성범죄율을 끌어내리는 주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으며 논란이 무성했던 '아청법', '셧다운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통해 사회 내에서 범죄 예방과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 문제의 산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과 같이 국가가 신경쓰는 부분이 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민 사회 내에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강화와 어렸을 때부터 학년별로 프로그램화된 성교육은 물론 성범죄 예방교육도 전문가에게 일정시간을 받고 상담교사를 배치해 올바른 성 의식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점진적인 안전 의식 개선을 통한 범죄를 매도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두 가지 톱니바퀴가 함께 맞물려 성범죄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고 매도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먼저 정비해야할 부분이 교육입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지루한 성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범죄 예방교육, 학년별로 주기적으로 듣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시행해야지만 이것이 점차 사회적으로도 확대되어 어른들 사이에서도 성범죄를 매도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⑤ 김한얼(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늘어나는 안전의 사각지대,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지난 5 월 10 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전기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5 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 들어 불산 유출과 가스질식, 대형 폭발 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보안망을 위협하는 사이버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7 년 12 월에 실시한 국민 안전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75%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일 것입니다. 또한 단시간 내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빨리빨리' 문화의 DNA 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와 같은 성과 만능주의를 양산해 이러한 안전불감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예방대책 및 매뉴얼의 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예방정책이 설립되어 사고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사고 원인을 개인의 책임처벌에 국한하고 있어 사회의 안전 대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발생한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재조명된 사고 자료를 축적하고 관할할 수 있는 '종합 콘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범국민적 안전의식 함양 및 확산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안전의식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인다

이렇듯, 대형화재, 폭발, 붕괴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인적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사고의 예방과 대응 측면에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들과 국민들이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안전이 재조명되며 안전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안전 의식 구조를 어떻게 선진화하고,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으로 가는 기로에 서있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기 위해 갖춰야 할 '선진화된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안전교육을 생활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행동 습관화와 효율적인 안전관리제도 마련을 통하여 안전의식의 고취와 안전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교과 과정에 있어 안전에 대한 교육과 그에 대한 커리큘럼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과 제도 구성에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앞으로 일어날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커리큘럼 제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둘째로, 기업 내부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롭게 제정하여 철저한 지침에 따라 안전사고에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공업이나 3D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위기관리 지침을 마련해, 실무자들은 일련의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감독관들은 매뉴얼에 의거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수행해나갈 때야말로 위에서 언급했던 안전 참사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의 주체인 '시민'이 주축이 된 안전문화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선진화된 안전문화운동이 일회성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의식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의 주체인 시민들 사이에서 선진화를 위한 '합의된 모종의 가치'가 공유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공유된 가치를 전범(典範)으로 안전의식의 선진화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新)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전국 교통사고율 최고의 도시였던 광주광역시에서 사고율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라는 가치를 공유하고자 시작하였던 '착한 운전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교통사고 1 위라는 오명을 얻게 된 계기는 낙후된 교통 인프라와 단속의지 부재 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교통질서를 경시하는 시민들의 의식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 근본부터 해결하려는 것이 이 운동의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운동의 범시민적 확산을 위해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2009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5 대 강령(낮 시간 전조등 켜기, 난폭운전 줄이기, 주간 전조등 켜기, 교차로 신호체계 준수/무단 횡단 금지, 서로 양보하고 먼저 인사하기 등)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민·관·경이 십시일반한 이 시민운동의 의의는 '교통안전 준수'라는 다소 진부하고 당연시되는 명제를 재조명함으로서, 시민들 사이에 공유된 가치의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이러한 의식이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식의 주체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옮김으로서 결국 자신들의 안전문제와 더불어 시민의식까지 한층 진일보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운동의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선진안전의식의 올바른 정착에서부터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삼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기존 이명박 정부 때의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입니다. 이번 새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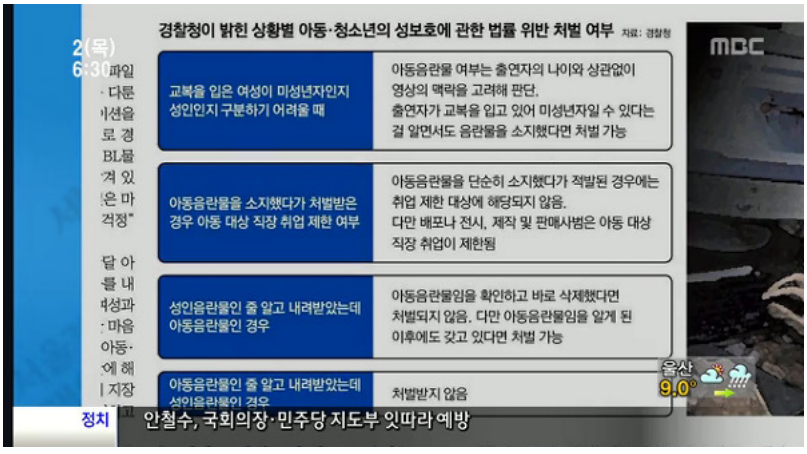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무리 정부와 기업 위주의 안전 정책을 발안하고 제정해봐야 안전의 주체인 국민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안전의식은 대한민국에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단초가 되어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의 주체인 국민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올바른 선진안전문화가 정착될 때야말로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선진국으로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⑥ 문지선(펜실베이나주립대학교 경영학과)

사회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산업재해 등은 우리나라의 안전의식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방안의 수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보고 안타깝고 답답하여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국민들이 수두룩한 것을 보니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관리가 좋은 쪽은 아니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범들을 조사한 결과 성폭력을 실행하기 전에 술을 마시거나 불법 포르노를 보았다는 것을 미루어보아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이하 아청법) 강화했고 학교폭력 단절을 위해 CCTV 설치와 학교 주변에 경찰을 늘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허나,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강화된 아청법은 2 조 5 항의 애매모호한 정의 때문에 창작계 직종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상의 표현물 유통을 적발할 시간에 현실의 아동들에 대한 보호강화에 촉구를 바라는 국민들의 주장은 무시된채 아청법은 여전히 표현물 감시에만 촉각을 곤두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정의와 어이없는 아청법 처벌여부. 아동음란물인 줄 알고 받았다가 성인음란물일 경우에는 처벌이 없다고 한다. (출처: MBC 뉴스)

학교폭력의 피해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교가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학교 이미지를 먼저 생각해 은폐·축소하려는 학교 때문에 애가 타는 심정입니다. 피해학생이 도리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으며 집단 성폭행에 연루된 학생이 '봉사왕'이란 타이틀로 서울 내 대학교에 당당히 입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갑자기 학교로 들이닥친 괴한의 칼에 피해를 입는 학생들의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과 사회에서의 협력이 뒤떨어졌기에 생기는 일입니다.



▲나몰라라하는 태도와 얼굴이 함몰되어 대수술을 받은 학생이 당한 폭력이 사소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른들. (출처: SBS 뉴스)

미국에서는 학교 내의 총기사건들을 계기로 '무관용주의'를 채택하여 학생의 연령이나 행동전력 등과 무관하게 학교 내 폭력 및 규정 위반 시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방문 목적과 신분을 명확히한 후 출입증을 받아야 비로소 교내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학교만이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생들의 참여로 안전지대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대처상황을 배우고 스쿨존 위의 도로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속도제한으로 달려야 하며 학교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버스의 STOP 사인이 올라오면 도로 위에서 오가던 모든 차들이 멈춥니다.



▲노란등이 켜지면 학교 주위를 달리던 모든 차들은 절대로 정해진 속도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출처: 구글 이미지)



▲ 우리나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불감증인 운전자들의 과속과 불법주차에 학생들은 아슬아슬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구글 이미지)

이렇게 미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미국은 학교안전사고들을 통해서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 번 큰 사고가 일어나면 번쩍하기만 할 뿐 그 열기를 실천까지 옮기는데 느린 대응과 어중간한 대처로 인해 제 2 차 안전사고를 다시 만든다는 점입니다. 학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초등학교로 들어와 칼을 휘두른 것은 외부인의 출입을 자유롭게 방치한 학교측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문단속과 경비강화에 대한 것은 여전히 고쳐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주 단순히 문단속과 외부인에 대한 경계와 단속이 더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인명피해는 쉽게 줄일 수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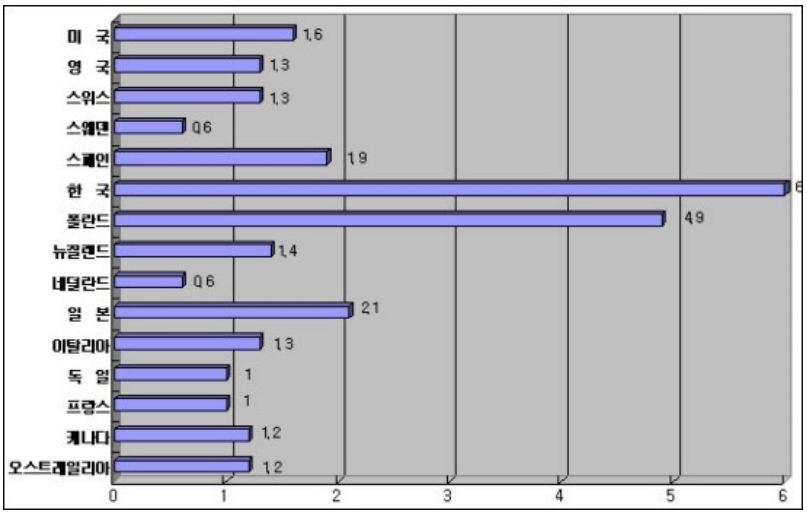
원인분석에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한 예방과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장해야 할 것입니다. 예방과 사고대처에 대한 교육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뉴얼 공급으로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⑦ 백유민(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고이지만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까지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던 것은 사실이나 발전을 이루어온 만큼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안전에 관한 정책이나 교육이 부족했던 것이다. 잇달아 일어나는 대형사고는 국민의 안전의식수준이 여전히 낮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재체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화재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스스로 안전을 살피기 위해서는 안전을 습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이 교육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예방의 차원에서도 큰 성과를 걷을 수 있다.

뉴스기사를 읽다 보면 차량 몇 대 간의 추돌 사고, 무단횡단 교통 사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등을 비롯하여 하루에도 여러가지 교통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및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른 뛰어난 교통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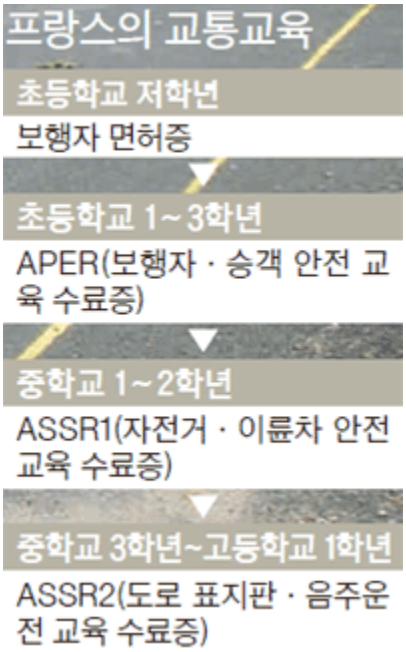


<인구 10 만명 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OECD International Road Traffic and Accident Database(IRTAD, 2005 년 7 월)> [자료=건설교통연대]

OECD 국가 중 최고의 교통선진국인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 교육이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웨덴 국민들이 처음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시기는 3 세로 부모와 함께 아이가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safe kids club'에 가입하여 유아기 때부터 시작한 교육을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학년이 바뀔 때마다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가 형성된 것에 비해 스웨덴은 보행자나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둔다. 이렇듯 스웨덴은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면서 얻을 수 있던 값진 교통문화인 것이다.

또한 교통안전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프랑스는 교통 관련 교육 및 정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보이고 있다. 위의 사진에서도 나타나듯이 교통사고로 인한 인구 10 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수로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6 명인 반면 프랑스는 1 명으로 6 배 가량 차이가 나며 이는 미국 1.6 명, 일본 2.1 명이라는 다른 국가들과의 수치 비교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교통안전교육증명서제도, 출처 중앙일보>

그렇다면 프랑스는 어떠한 방향으로 교통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일까? 프랑스는 어린이들을 잠재적 운전자로 바라보며,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철처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정책을 삼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시기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학교교통안전교육증명서제도'이다. 이를 수료하지 못하면 운전면허를 볼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문화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유년기에 잠깐 배운 교통안전이 전부이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허울뿐인 교육이 전부이다. 2011 년부터 운전면허의 간소화를 하여 시민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게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져 사고의 위험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만 갔다. 이렇듯 우리는 교통 교육에 있어서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잠깐 배우는 것도 간소화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교통안전불감증이 높아만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잠깐의 6 시간짜리 안전교육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시의적절한 안전교육이 시행되어야 안전불감증도 해소되고 선진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통안전교육의 사례뿐만 아니라 화재, 산업재해, 추락, 가스폭발 등의 사고에 대해서도 교육이 미비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모범적인 정책 및 교육을 본보기로 삼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⑧ 송경림(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2013 년 5 월 27 일, 대구 여대생 실종 사건이 이슈로 떠올랐다. 필자도 SNS 에서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찾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다. 피해자는 술을 먹고 택시를 탄 후 사라졌으며 사라진 다음날 오전 10 시 30 분 경 대구의 한 저수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시신은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얼굴에 심한 타박상과 윗 치아 3~4 개가 부러져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성폭행 후 폭행을 당해 사망했을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는 2008 년 '나영이사건'으로 성폭행사건의 큰 이슈로 대두되었다. 가해자 조두순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12 년으로 감형되는 것을 보며 이러한 형량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영화 "도가니"를 보면서 장애아동에게 무자비한 성폭행을 한 선생님들에게 부당한 압력에 의한 합의를 해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사회가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다. 이렇게 일반인들의 성범죄에 이어 최근에는 "윤창중 사태"로 공직자의 성희롱 사건에까지 이르러 우리는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 있다. 필자는 이대로 우리의 안전이 괜찮은지 의문이 든다.

성범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성범죄와 관련된 형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성범죄 형량이 3~5 년임에 반해 미국의 경우 12 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 형량은 최소 25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합의여부로 성범죄자의 형벌이 낮아지고 공탁금을 통해 형을 낮추는 경우도 존재하고 "술김에", "우발적으로"라는 이유로 형이 낮아지는 모습을 주위에서 접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성범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을 정하고 공탁금을 통해 형이 감형되는 것과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감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오히려 가중처벌 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어디에서도 성범죄를 합의를 통해 형을 정하는 나라는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13 세 미만의 아동은 그의 법적 보호자가 합의를 해주는데 이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범죄와 관련된 것을 합의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범죄 재범율이 50%에 이르는 시점에 합의만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위험한 처사이다. 또, 공탁금을 통해 형을 감형해주는 것 역시 사라져야 하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형법 제 10 조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형을 감형한다는 조항이 있다. 필자는 오히려 형을 감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음주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엄중한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범죄에 관한 법률을 좀 더 강력하게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법을 강력하게 만든다고 성범죄율이 순식간에 줄어들 수 있을까?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님께서는 성폭력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성폭력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찰이 필요하며 그 원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하셨다. 상당수의 성범죄가 아동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생애 단계별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초, 중, 고 시절에 받은 성교육을 떠올려보면 지루한 프레젠테이션 시간이었다. 외부 강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열심히 듣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어릴 때부터의 꾸준한 성교육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성범죄률이 높은 이유도 어릴 때부터 제대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도 크다고 생각한다.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평균 5.17 시간, 중학교는 3.5 시간, 고등학교는 5.5 시간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초등학교는 학교 성교육 의무 시수의 50%, 중학교는 33%, 고등학교는 60%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교육의 의무화 돼야한다. 실제로 필자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배웠던 성교육에서는 누군가 성폭행을 하면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한다고 배웠었다.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느껴지는 실질적인 성교육이 맞을까?

생애 단계별로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아동성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성교육이 필요하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역시 초, 중, 고 수준에 맞추어 실질적인 성교육을 해야 한다. 실제로 고등학생에게 성폭행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성교육을 배우는 것은 학교의 자습시간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게 된다. 즉, 20 대가 되기 전의 올바른 성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또, 학생들의 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성교육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괜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성교육은 정규교육보다 더 중요한 학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지하게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좋은 질의 성교육을 꾸준히 받아온다면 이러한 학생들의 태도는 사라질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성범죄가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음주교육이 필요하다. 어제 발생한 사건인 대구 여대생 실종사건의 피해자는 술이 만취해 있는 상태에서 택시에 탄 것이 발단이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생의 음주문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술을 맛있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죽자 식으로 마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교육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각 단계별로 그들에게 알맞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올바른 성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면서 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임을 인식시켜 줘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춘기인 중학생 시절에는 사춘기에 맞는 성에 대한 지식을 알려줘야 하고 고등학생 때는 20 대가 되기 이전에 실질적인 성 지식을 교육시켜야 한다. 대학생들에게도 성교육뿐 아니라 음주교육에 이르러 20 대가 되어 그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성범죄를 줄이고 우리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며 생애 주기별로 알맞는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⑨ 신동일(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995 년 4 월 28 일 대구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사고당일 아침, 달서구 상인 동 1 호선 건설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가 폭발, 현장에 있던 시민 101 명이 사망하고 145 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의 안타까움이 더욱 커졌던 것은 101 명의 사망자 중 42 명이 등교 길에 변을 당한 학생들이었다는 피해조사 결과였으며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인명피해와함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는 약 600 여 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구지하철참사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안전의식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된 이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늑장대응으로 빚어진 인재였던 대구지하철공사장 폭발사건. 출처: Google>

조사결과, 사고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쇼핑몰 신축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작업 중 실수로 도시가스 배관에 직경 75mm 의 구멍 31 개를 뚫어 누출된 가스가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되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은 늑장대응이 사고를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중 가스관에 구멍을 뚫은 공사 측은 가스관이 파손된 지 30 여 분이 지난 뒤에야 도시가스 측에 신고하였으며, 신고를 받은 대구 도시가스측도 신고 후 30 여 분이 지난 뒤에야 사고현장으로 통하는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늑장대처가 대형참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안전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불가항력을 지닌 자연재해를 논외로 두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재난, 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도,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로 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갔을 때에도 우리는 사건, 사고방지에 대한 진지한 대응책을 생각했을까요? 사고 후에 경찰 및 구조인력을 늘리고 치안유지 기관을 증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이 나라의 사건, 사고가 진실로 없어지게 될까요?



〈헌법에 명시된 유일한 안전교육 방재안전관리. 출처: 방재안전관리 연구원〉

정부주도하의 안전관리 즉, 제도적 장치를 통한 관리와 대응책으로는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설물과 법규를 보완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참여가 없다면 꽃을 심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들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관이 함께 세워야 할 안전관리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안전시설물의 확충, 관리기관증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007 년에 실시된 국민 안전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75.7%가 안전불감증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보다 앞선 2001 년, 국무총리실 안전관리 기획 단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대부분이 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조사되었는데요. 2001 년에 안전의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국민들이 6 년이 지난 뒤에도 안전불감증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은 자가당착적 문제이며 의식수준의 근본적 계몽이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앓고 있는 안전의식 수준 미달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였습니다. 전후 60 년 만에 고도의 압축성장을 성공시켰고 특유의 한국식 산업정신인 '빨리빨리 정신'은 미국에서 방영되는 코미디 쇼에서 한국인들을 표현할 때에 자주 이용될 정도로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인의 이미지로 굳혀지기까지 했었죠. 우리가 60 년만 에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빨리빨리 정신'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룬 이 정신은 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결과주의를 낳았습니다. 결과주의는 생산의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기에 사회적 의식에서 안전이라는 중요한 제반사항의 부재를 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결과가 좋다면 적당히 넘어가자'식의 적당주의에 매료되었었으며 고도발전에 수반되어야 할 국민의식의 발전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압축성장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지만 빠른 성장만큼 전반적인 안전의식수준의 하향으로 국민들의 생활 불안감이 증가하였고, 나아가 이념적 대립구도에까지 이기주의가 자리잡게 되어 사회통합 악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는 이기주의와 적당주의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참여와 의식계몽을 위해서 나만 아니면 돼 식의 이기주의와 가시적 결과만 중요시하는 적당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호주의 안전관리의식은 공장장부터 말단직원까지 철저한 교육을 시킬정도로 엄격하다. 출처: 구글〉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직 노동자가 많은 호주는 세계적으로 안전의식이 투철한 안전관리 선진국입니다. 시드니에 위치한 전기 발전소 회사인 델타 전기사는 현장 근무자가 아닌 사무직 근무자일지라도 3 개월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전 직원은 응급구조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근무자에 대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전기설비는 2 년마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Blue Scope Steel 철강회사는 직원이 안전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퇴사시킬 정도로 안전에 대한 규정이 엄격합니다. 근무자는 작업 전 감독관에게 항상 안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공장장부터 말단직원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외부기관의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안전사고에 대한 선진형 의식과 관리체계뿐만 아니라 호주 인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참여에도 본받을 만한 의식수준을 보여주는데요, 호주에서 유명한 본다이 누드비치에는 항상 안전 요원이 상주하는데 놀랍게도 이 안전요원들은 모두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호주의 사례들과 현행들을 통해 세계적인 선진안전관리국으로서 민-관이 함께 세우는 안전관리체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선진안전관리국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민-관 참여 안전관리체계를 세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안전의식지수(PSCI)는일상 생활과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한 행동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위적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인의 안전 역량 형태와 태도, 습관, 지식을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PSCI 를 수치화 시키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측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안전의식에 대한 평가치를 제공하고 상황 별 올바른 대응책을 제공하는 등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SCI 수치는 안전의식수준의 측정치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대응책과 안전상식 등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퍼뜨리기엔 접근성과 파급이 미약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호주나 여타 선진국들처럼 국민들의 안전관리참여를 유도하기위한 제도적 상여 또는 구속이 있다면 어떨까요?



<국가재난정보센터의 PSCI 측정 서비스>

개인의 안전 역량 형태를 측정해 주는 PSCI 점수를 통한 국민의 상여 또는 구속을 통한 안전관리참여 장려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술자격증 대신 안전관리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참여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나 지역사회 안전대응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참여하는 캠페인을 기획하여 안전의식의 필요성과 자부심을 사회전반에 끌어내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선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과정 때부터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의식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요합니다. 또한 PSCI 측정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제도적 구속력을 가지던 상여제도를 마련하던, 국민들의 자발적 안전관리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지수에 대한 사회적 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PSCI 수치를 자랑스러워하고 마땅히 측정해야 하는, 안전의식에 대한 공부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는 사회분위기가 조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의식의 선진화는 정부의 시설점검, 제도보완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실패를 거듭할 것입니다. 우리는 호주를 비롯한 여러 안전관리 선진국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만성안전불감증에 숨어있는 이기주의와 적당주의를 타파해야 할것입니다. 비옥한 땅에 심은 꽃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 없인 오래가지 않아 시들고 져 버릴 것입니다. 폐허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해내었던 대한민국의 저력이 이제는 안전관리에서 다시금 빛을 바라길 기대해봅니다.

⑩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2003 년 2 월 대구 지하철 참사, 192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148 명을 다치게 한 전 국민을 불안과 충격으로 빠뜨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방화범은 지체장애 2 급의 김모씨로 그는 '신병을 비관해 자살하려 했는데 나 혼자 죽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2 년은 유난히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온갖 성범죄 사건이 1 년 내내 터져 나왔고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8 월, 의정부 전철역에선 유모씨가 침을 뱉었다고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칼을 휘둘러 8 명을 다치게 했고, 이어서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김모씨가 예전 직장 동료들을 찾아가 칼을 휘두르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행인 2 명에게도 칼부림을 했습니다. 경기 수원에서도, 울산에서도, 인천 부평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성폭행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한 채 이웃동네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한 취객이 가정집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믿기 힘든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2012 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범죄위험(64%)을 우리 사회의 최고의 불안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매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강력범죄로 인해 치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발적 범죄가 계속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지하철, 심지어 내 집까지 대한민국에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강력범죄를 피하려면 외진 곳으로 다니지 말고 사람이 많은 길로 다니라는 어른들의 조언이 무색해 보입니다.

잊혀질 만하면 나타나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묻지마 범죄', 아무 이유 없이 거리나 집 안에 있는 시민을 흉기로 무차별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의 앞에서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처럼 국민 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이루는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처방을 적극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장래는 한마디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지마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요?



2010 년 8 월 발생한 옥탑방 부부 살해 사건, 강도강간 혐의로 14 년 6 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단 3 개월 만에 범죄를 저지른 윤씨. 그는 '일거리를 찾지 못해 배회하던 중 화목한 웃음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출처: MBN TV)

묻지마 범죄는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인의 정신적 · 성격적 결함이 일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우한 가정환경, 실직, 그리고 이혼같은 개인의 불운과 사회적 박탈이라는 사회 · 경제적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의 범행동기를 들어보면 실직, 이혼, 사회적 고립 등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세상 살기가 싫어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경쟁지향적인 사회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과 이 중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전체에 대한 격렬한 분노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표출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있었던 묻지마 칼부림의 가해자는 모두 실직자이거나 사회적 외톨이였습니다. 여의도에서 난동을 부린 김씨는 4000 만원의 카드빚을 진 신용불량자에 실직자였습니다. 의정부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유씨는 10 년 동안 일정한 직업도, 집도 없이 떠도는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울산의 이모씨 역시 3 년 전부터 무직자로 혼자 방에 틀어박혀 지내왔습니다. 수원 살인 사건의 강모씨는 출소한 뒤 막노동으로 살았고 부평의 김모씨는 범행 하루 전날 실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의 대부분이 사회에 대한 반감이나 불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병리 현상으로 해석하고 풀어나가려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괴로워하는 낙오자들이 우리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공동체적 관심을 갖고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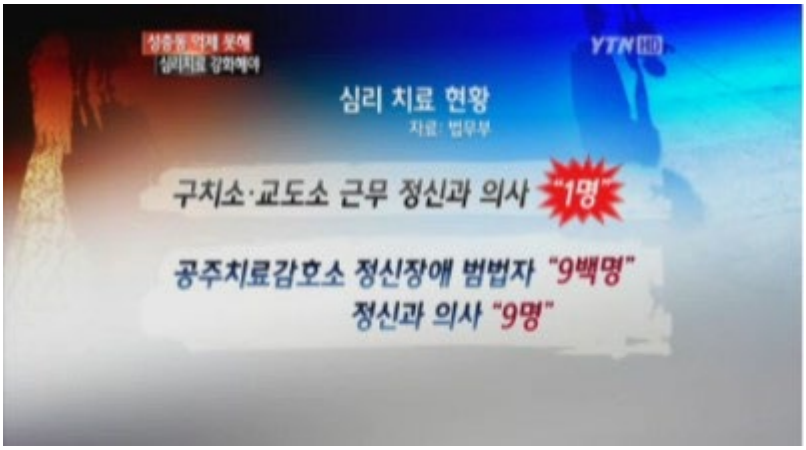
우발적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출소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줄여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용자에게 적절한 의료처우를 제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 기반을 내실화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교정시설 수용자의 보건의료처우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과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기대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치료 감호 대상자 담당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우리나라는 의사, 간호사, 심리사 등 직원들이 1 인당 담당하는 수감자가 3.3 명으로 영국(0.5 명), 독일(0.7 명), 일본(1.5 명)에 비해 크게 열악한 수준입니다. (사진출처: 중앙일보)

특히 사회의 안전 확보라는 테두리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사이코패스를 포함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묻지마 범죄의 피의자들의 대부분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채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범죄자들이 정신질환까지는 아니어도 정신이 황폐해지는 등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수감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강력범죄자들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교정시설의 수감자가 4 만여 명에 이르지만 심리치료 등을 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는 전국에 단 1 명뿐이라는 놀라운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 50 개의 구치소와 교도소가운데 정신과 의사가 있는 곳은 진주교도소 단 한 곳뿐이고, 해마다 치료보호 처분을 받은 정신장애자 9 백 명이 수감되는 공주치료감호소에도 정신과 의사는 9 명에 불과합니다.



김길태가 치료받던 진주교도소는 정신과 의사가 1 명뿐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외부 병원에 소속돼 있으면서 시간제로 일하는 계약직 근무자였습니다. 그들을 순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적 장치만 제대로 갖춰있었더라면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진출처: YTN 뉴스)

성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 재범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지금처럼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에 손을 놓고 있는다면 교정교화가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출소 후의 재범 가능성도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시 사회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감자들을 교정시설에 격리만 시켰다가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심리치료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잠재적 강력범죄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감자들의 정신치료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를 점검해보고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빈곤하거나 소외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좀 더 섬세한 배려와 관심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 해체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해체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범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이기심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불우한 환경과 능력 부족으로 적응과 성취에 실패해 성격이 왜곡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이웃을 외면한 우리 사회의 이기심은 간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대응과정에 있어서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와 내 가족이 희생당하면 안되니까 '당장 대책을 내놓아라, 불안하다'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때 그때 자신만 걸려들지 않으면 금새 사건을 망각해버리고 이를 고치고자 하는 자세가 흐지부지해 지는 것도 이기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1 인당 소득 3 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고, 외국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경쟁의 패배자나 사회적 약자가 세상을 저주할 만큼 비정한 사회가 되었다면 이를 고칠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처방이 병든 사회의 치료방법일 것입니다.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이들이 겪는 일상의 좌절과 억압이 잘못된 출구를 찾아 또 다른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평소 이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가족과 공동체, 우리 사회의 치유력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서로 외면하고 나만 잘살면 된다는 삭막한 사회가 아닌 서로를 보듬고 살피고 돕는 더불어 사는 사회, 성숙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첫 걸음이 아닐까요?

⑪ 홍용남(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오늘도 뉴스를 보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성범죄, 교통사고, 화재사고 소식을 알 수 있다. 각종 안전사고로 점철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피해자의 안전부주의 내지 안전불감증인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가해자의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있다. 무단횡단이라는 목숨 건 도박을 한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야 안죽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안전불감증은 우리 삶 깊숙히 침투하여 평온한 삶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의 팽배는 우리의 어린시절부터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매체와 무관하지 않다. 매체는 안전에 대해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시켰는가? 매체는 국민정서에 따라 움직인다. 국민정서가 매체로 투영되기에 매체를 국민정서에 의한 스트림으로 바라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 대다수가 혐오를 피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안전사고는 결코 아름답지 못함에도 매체는 우리에게 혐오를 전달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불편함으로 점철된 매체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 공익광고협의회의 금연광고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간단한 예로, 우리는 많은 성범죄자들이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언제나 모자이크 처리 되어 이 세상과 동떨어진 인물로 묘사되곤 한다. 적어도,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이웃'의 개념으로는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장면에서도 찌그러진 차량만이 보일 뿐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혈흔이나 그들의 차량에 있던 추억들이 피로 점철된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공익광고나 포스터에서 더욱 극명히 나타난다. 외국의 금연광고는 흡연시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을 혐오스러울 정도로 묘사한 포스터나 공익광고가 많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담배 연기에 찡그리고 있는 여자 아이가 담배 연기가 사라지자 환하게 웃는다. 그리고 말한다. "이제 아빠한테 좋은 냄새나" 너무나도 아름답다.

각종 심리학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잔혹한 장면을 볼 때보다 메시지를 우회하여 전달한 장면을 볼 때 전달력이 크다고 한다. 이유는, 사람들이 잔혹한 장면에 대해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잔혹한 장면을 인지했을 때의 파급효과와 지속시간은 우회된 아름다운 장면을 봤을 때의 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다. 실제로 인간은 트라우마에 대해 강한 각인효과를 경험한다. 5 살도 안된 어린시절 끔찍했던 경험을 수십 년이 흘러서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쟁을 겪은 군인들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잊지 못한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잔혹한 장면을 그대로 투사할 경우, 단일 메시지 전달효과는 낮을 지라도 지속적인 각인효과는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담배가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금연포스터. 우리나라의 포스터와 어떻게 다른가?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은 우리가 간접적인 트라우마조차 경험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은 SNS 를 통해 기존 매체가 전하지 못했던 각종 사고들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잔혹함 그대로의 투사는 국민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한 커플이 주변에 차량이 없자 무단횡단을 하다가 일명 '제로백'이 뛰어난 차량에 부딪쳐 날아가는 장면이 공개됐다. 분명 커플 주변 30m 에는 차량이 없었다. 하지만 성능이 뛰어난 차량은 순식간에 커플을 덮쳤고 그들은 피해를 입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너도 나도 "모두 조심하자"라며 일명 '소환'(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에게 게시글을 알리는 일)을 하며 친구들에게 영상을 전파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영상 그 자체를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게시글을 본 적이 있는가? 물론 없다. 왠만한 사고 보도에대해 대중들은 무감각하다. 연일 뉴스에서는 "오늘 오후 10 시 경 경부고속도로에서 3 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 명이 숨지고 4 명이 중상입니다"라고 외친다. 전국에서 일어난 야간 성범죄, 묻지마 살인 사고를 보면서도 친구들과 놀다보면 어느새 새벽 2 시를 향한다. 그 때 생각한다. "아 세상 무서우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야지." 중요한 것은 조심하고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단횡단을 하면서 "차 오기 전에 빨리 건너야지"가 아니라, 무단횡단 자체를 혐오하는 사고를 심어줘야 한다.

수 많은 금연 광고들보다도 반복적 흡연으로 인해 발병한 암으로 사망한 개그맨 이주일의 금연 권고가 대중들에게 더욱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이주일 세대들은 자신과 함께 세월을 살아온 이주일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흡연인구가 급감했다. "도박 하지 맙시다", "도박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합니다"라는 카피보다 연예인들이 도박으로 패가망신하는 것을 봤을 때 대중들은 더욱 큰 메시지를 얻었다. 불편하고 잔혹한 현실 그대로에 대한 투영은 혐오를 가져오고 혐오가 대중들에게 특정 행동을 피하도록 강화시키는 것이다.



▲교통사고 현장, 불편한 마음에 시선을 피하고 싶은가? 현실은 이것이다.

안전에 있어 매체의 역할은 강력하다. 어린시절부터 우리는 매체를 통해 안전지식을 습득하고 혐오를 습득한다. 아름다운 것만을 투영하다 보면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끔찍한 것을 접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해준다. 유독, 공익광고 및 포스터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등장한다. 안전에 대한 것마저 감성으로 해결할 생각이라면 빨리 접는게 좋다. 물을 아껴 쓰자며 "지구가 목말라요" 백날 부르짖는 것보다 수도세 인상이 효과가 좋을 때도 있다. 때로는 감성적 호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다.

비극적 사고를 막기 위해 비극을 노출할 때다. 불편한 진실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고편을 들려줘야 한다. 각종 사고가 나와 동 떨어진 미지의 사람들이 겪는 경험이라고 오판하는 순간 누구라도 끔찍한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고와 그로 인한 죽음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겪는 것이 아니다. 예고도 없다. 그들도 꿈이 있고 가족이 있었으며 당장 10 분 뒤 하고싶은 목표가 있던 사람들이다. 매체들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슬픔까지도 비춰야 한다. 그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끔찍한 '5 분 뒤'를 겪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⑫ 문용찬(동국대학교 사학과)

1986 년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큰 사건이 있었다. 이 원전의 폭발로 엄청난 방사능이 누출되어 수많은 피해가 잇따랐다. 이러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2011 년에는 3 월 11 일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북아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강타함에 따라 대량의 방사능의

누출이 재발되었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큰 사고들로 인해 세계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감심이 커졌고, 더 나아가 안전의식 고취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기조에 편승하여 한국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다. 언론에서는 1995 년 5 월 동아일보가 안전관련 분야를 재고하는 기사를 10 회에 걸쳐 쓰면서 안전의식 함양에 힘썼다.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 안정행정부가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한다며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다는 슬로건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언론·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 위, 산업재해 사망률 1 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며 10 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룬 한국이지만 유독 안전 분야에서는 낙제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우리의 안전의식 실태를 인지하는 한편 근본적인 원인과 그 대안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한국은 교통사고 사망률 1 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출처: 기획재정부

과거 한국은 보릿고개를 넘어 '등 따뜻하고 배부른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다. 사회는 등 따뜻해지고 배부르기 위해선 부지런함과 신속성을 강조해 빠른 결과물을 얻길 갈망했고 이는 '빨리빨리 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졌다.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한국은 반세기 채 지나지 않아 명실 공연한 경제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러한 문화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였다. 예컨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1994 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 년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다. 결국 '빨리빨리 문화'에 기인하여 과정을 무시하고 속도와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만연하여 이러한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즉, 우리는 빠른 결과만을 추구한 나머지 안전은 뒷전으로 밀어내게 되었다. 이는 곧 안전 불감증의 팽배로 이어졌다.



▲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안전 불감증을 야기시켰다

또한 한국인은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냄비근성' 성향을 띄게 되었다. 빨리 끓고 빨리 식듯이 어떤 일에 쉽게 흥분하고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을 의미하는 말이다. 어떤 대형재난이 닥쳤을 때에는 범국민적으로 종전의 안전의식의 결핍을 지적하며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양은냄비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그 사건을 잊어버리게 된다. 결국 관심의 고·저조가 반복되기만 할 뿐 지속적인 안전의식의 진보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1999 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우 시티(slow city)' 운동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항상 경쟁하고 빠름만을 추구하여 삶의 여유가 박탈당하는 대신, 느림의 즐거움과 행복을 되찾자는 운동이다. 따라서 슬로우 시티의 철학은 느림의 기술(slowware), 다시 말해, 느림, 작음 지속성에 있다. 한국도 청송, 청산도, 증도 등이 슬로우 시티로 지정되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역설하며 느림의 기술(slowware)을 강조하고 있다.



▲ 느림의 기술을 강조하는 슬로우 시티(slow city)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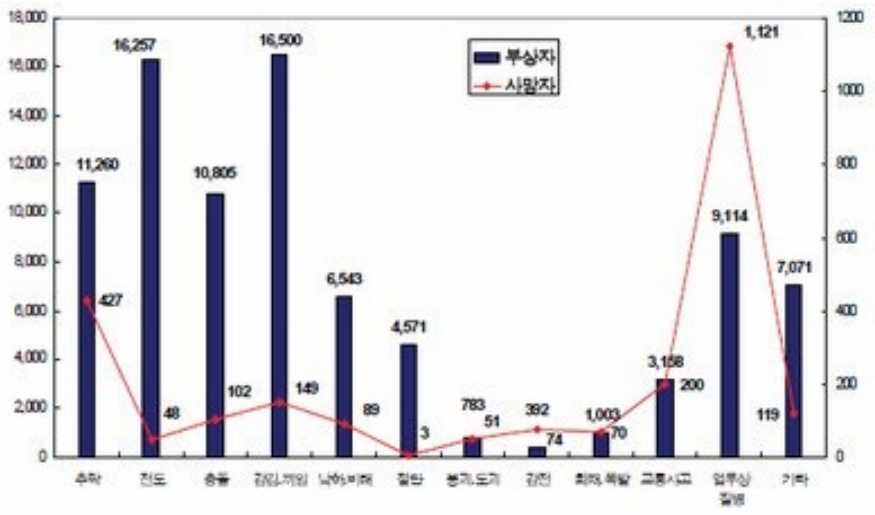
슬로우 시티 운동에서 한국사회에 적용시켜야 될 철학의 덕목은 ‘느림’과 ‘지속성’이다. 먼저 ‘느림’은 안전의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과속, 신호위반 등을 하는 이유는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빠른 결과물을 얻길 원하는 성향과 비슷하다. 만약 운전자에게 느림의 마음을 투영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 운전자는 한 박자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게될 것이고 이는 더욱더 안전한 운전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느림의 미학’을 마음에 품고 실천한다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교통 환경은 한층 나아져 결국 안전한 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속성’이다. 이것은 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반짝 관심을 보이며 안전의식 함양을 부르짖는 종래의 국민성인 ‘냄비근성’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느리지만 지속성 있게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운동을 펼친다면, 분명 한국의 안전의식에 진보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때 그 역할은 그 어느 집단보다도 언론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맡아야 될 것이고 국민들 또한 적극 동참해야 될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야기된 안전관련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인 ‘느림’과 ‘지속성’을 제시하였다. 물론 속도를 중요시 하는 사회에서 슬로우 시티 운동은 비현실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빠름에서 느림으로의 대체가 아니다. 빠름의 세상 속에서 느림의 역발상을 통해 ‘빠름과 느림의 중도’를 추구하며 더 나아가 안전문화의 정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⑬ 이윤정(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4 월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카고 크레인 작업을 하던 도중 적재함 위에 운반 중인 화물의 위치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위치를 잡아주던 근로자가 화물과 충돌하여 지면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기만 하였어도 사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일이었다. 아래의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대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크다.



〈산업 사망 재해에 대한 형태별 현황-한국건축시공학회논문〉

산업 사망 재해에 대한 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끼임, 전도, 추락 등의 순서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안전조치를 충분히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재해들이다. 밑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한해 당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4 만 명이 넘는다. 이는 삼 년에 걸쳐 꾸준히 넘어오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예방만 확실히했다면 지금도 열심히 일하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람들이다. 적어도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교육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구 분	상시근로자수	재해자수	전년대비 (증감율%)	재해율 (증 감)	사망자수	전년대비 (증감율%)	사망만인율 (증 감)
2012.1-06	15,786,462	44,726	330 (0.7)	0.28 (-0.02p%)	1,069	35 (3.4)	0.68 (-0.03p)
2011.1-06	14,560,840	44,396	-3,670 (-7.6)	0.30 (-0.02p%)	1,034	6 (0.6)	0.71 (0.01p)
2010.1-06	14,604,938	48,066	2,861 (6.3)	0.33 (0.01p%)	1,028	-31 (-2.9)	0.70 (-0.05p)
'10.06월 대비		3,340명 (6.95%) 감소			41명 (3.99%) 증가		

〈2012 년 2/4 분기 산업재해현황에 대한통계자료-안전보건공단〉

현재 충청도에 있는 안전체험 교육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가상안전체험교육(컴퓨터그래픽 입체영상, 가상현실 위험요소 발굴)과 건설안전체험교육(건설리프트, 철골구조부/안전망, 안전대 매달리기), 그 외 화재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령 제 33 조 1 항에 각 근로자에 대한 의무 교육시간이 규정되어있다. 근무하는 곳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나 건설 일용근로자의 교육시간은 4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외 다른 국가의 안전교육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C.D.M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공사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500 인이거나 예정 공사기간이 30 일 이상 20 인 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모든 현장에 적용된다.C.D.M 제도란 예를 들어 설명하면 건설공사 전 과정에 연계되어 있는 발주자, 안전감독자, 설계자, 원도급자, 하도급자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이들이 안전사항을 어겼을시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로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ASIG)과 제국보험법(RVO)을 근간으로 안전보건기준을 민간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한편, 벌칙에 의하여 법령준수를 강제하지 않고 스스로 준수하도록 하게 한다. 독일은 단순한 사고 예방차원을 넘어 독일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 직업병 예방 더 나아가 인간성 존중의 정신을 담고 있다. 즉 '근로자에게 최적의 근로조건을 마련해 주어 작업장에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있어서 규제된 자율을 중시하고 각 사업장의 이해대변기구(직장평의회)와의 협력, 작업장 내, 외부 주체 간 협력 건강보험 조합간의 협력 등 참여와 협력을 중시하였다. 또한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한 법률이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로 활용이 어려워 역동성과 유연성을 강조하여 각 사업장의 개별 책임을 강조하였다.

EU 에서는 근로자 안전, 보건 개선시행에 관한 EU 규범에 따라 안전보건 코디네이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검토, 자문, 지도, 감독하며 총괄적 책임을 진다.

일본의 경우는 모의터널, 가상체험영상관, 입체영상관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간 2500~3000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입체 영상관을 통해 교육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3 차원 입체영상 시뮬레이션으로 현장의 모든 위험사례를 먼저 시각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개개인이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 위험사례에 대한 대처방법을 체험하게 하고 나머지 교육생들은 체험자의 위험 대처 방안을 보면서 토의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그림 3. 일본 교육장의 입체영상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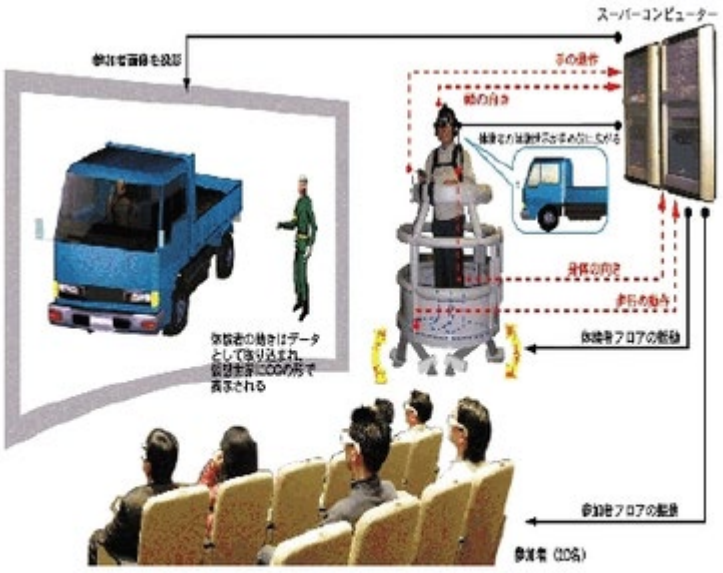


그림 4. 일본의 가상체험 교육의 시스템

〈직접 교육자가 위험성을 체험해보고 자각할 수 있는 일본의 교육 방식 -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

또한 이들 국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업장에 보험 요율을 다르게 적용시켜 부담을 증가해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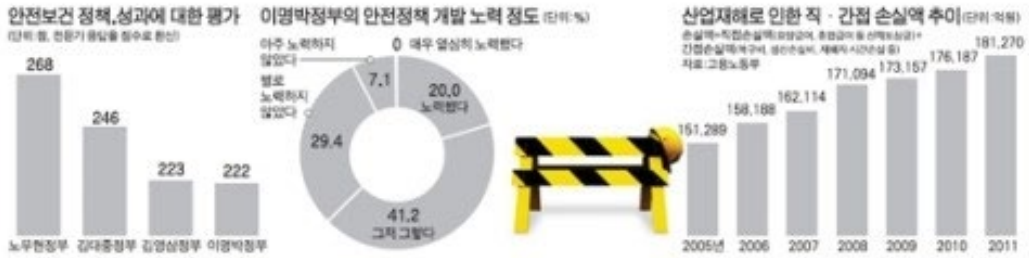
■ OECD 주요국 산재사고 현황

구 분	한국 ('06)	일본 ('03)	독일 ('03)	미국 ('03)	영국 ('04/'05)
근로자수(천명)	11,688	53,350	42,164	106,183	25,480
재해자수(명)	89,910	132,936	886,903	4,365,000	161,874
재해율(%)	0.77	0.25	2.99	4.11	0.64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명)	1,332	1,628	735	5,559	168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	1.14	0.31	0.25	0.52	0.07

〈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 는 OECD 국가 중 가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울경제〉

이들의 산업재해율은 위의 자료와 같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1 만 명인데 반해 다른 국가들의 수는 4~5 만 명 정도이므로 이를 감안해 계산해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 OECD 의 여러 국가 중에 높은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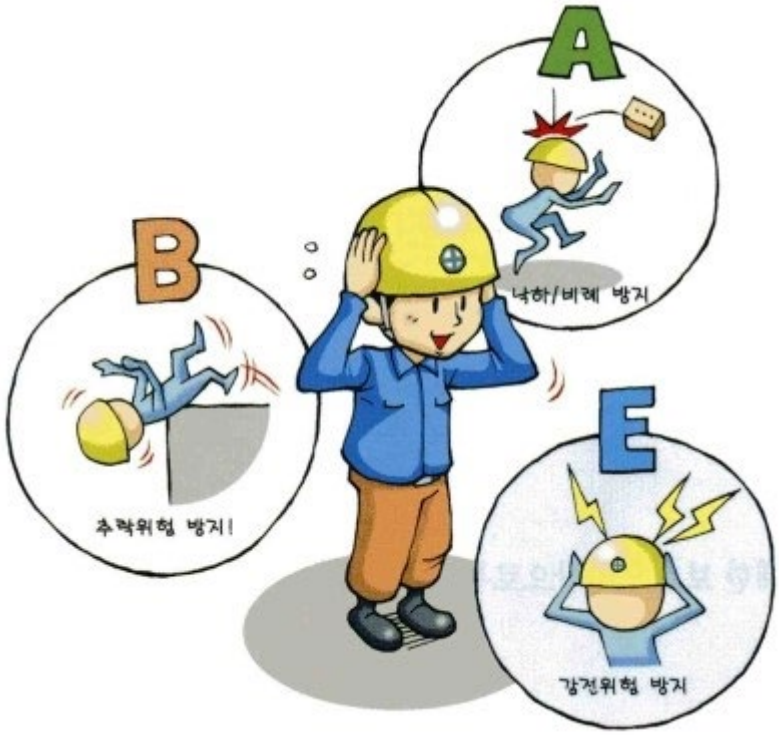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교육은 투자 대비 발전이 부족하다. 그 이유로 다른 국가들은 산업안전교육을 유료로 진행하는데 반해 우리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논점을 들 수 있다. 무상으로 제공하면 모든 이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발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앞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잠깐 언급하였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자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그저 교육으로만 끝이 나고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의무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 투자대비 안전에 대한 성과가 미약했고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갈 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방재안전연구관리센터〉

일본의 경우처럼 직접 위험을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넣거나 산업재해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여주어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국과 독일 같은 EU 국가의사례처럼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담시켜 전반적인 통제를 하게 하여 꼼꼼하게 문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이들을 따로 배치해 두지 못한다면 독일의 경우처럼 노동자들 스스로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장에 그 위험성을 깨우치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활동을 하면서 작업장 군데군데에 보이는 위험요소들에 대해 서로 주의할 수 있는 의식을 길러 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조가 존재하는데 이곳에서 임금 협상하는 것 외에 노동자들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근무지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각하고 노조 구성원들에게도 이에 대한 교육과 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려야 한다.



〈 근로자가 근무환경에서 늘 주의하고 교육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부산산업안전본부 〉

교육은 스스로 깨달음이 없다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생들 스스로가 산업재해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고 인지하고 교육에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하고 교육을 하는 강사들도 그저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줄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사례와 시각자료를 준비해 교육생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⑭ 전아영(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지난 25 일 새벽, 대구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여대생이 다음날 오전 69km 나 떨어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명 “대구 여대생 실종사건” 이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범인의 윤곽을 못 잡고 있다. 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피해 여대생은, 하의가 벗겨지고 상의는 속옷만 걸친 상태였으며 치아 3~4 개가 부러지고 얼굴에는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심장과 폐 등의 장기가 손상돼 있었으며, 성폭행의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가녀린 그녀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숨지게 만든 것이다. 현재까지, 그녀를 태운 택시기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고 있으나, 경찰은 제 3 의 인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용의자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8 년 12 월에 있었던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 2012 년 8 월에 있었던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 우리 주위에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성폭행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힘없는 어린아이들에서, 한창 꽃다운 나이의 여성들까지 그 대상은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을 향해 있으며, 그 수법은 나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그녀를 숨지게 한 범인이 받을 처벌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총 12 년의 형량을 선고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과연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가 성폭행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일까?

한 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화학적 거세는 범죄자의 인권 침해라는 반대에 부딪쳐 주춤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그 범죄자들에게 지켜줘야 할 인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들에게 자비가 필요할까? **그들을 인권을 가진 '人'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2012 년 기준으로, 9059 명의 성범죄 전과자 중, 4070 명(재범률 44%)이 2 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는 성폭행 범죄자의 재범률이 80%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이처럼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굉장히 높은 반면, 가해자 구속 건수와 피해자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해 성범죄자의 처벌 법 개정 및 현실적 지원 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모두 이미 성폭행 범죄가 일어난 뒤, 가해지는 처벌이다. 피해자가 상상도 못할 고통과 치욕을 맛본 뒤에,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는 것이다. **즉, 미리 성폭행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은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보고 싶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이 짙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즘 성 교육에 대해 개방하자는 여론이 대세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라지 못한 부모들이 성에 오픈되어 있는 자식들을 보게 됐을 때 담담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

다음으로는 **법에 따른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성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생겨났겠는가. 다른 나라들의 성 범죄자 처벌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성 범죄자 처벌은 정말 턱 없이 미약하고 솜방망이 수준이다.

마지막은 **사후관리**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성 범죄는 그만큼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발목에 전자발찌 하나 차고나면 끝인 처벌은 더 이상 안 된다. "왜 우리나라에서 성 범죄 재범률이 높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온다. 그만큼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처벌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요즘은 딸 가지기 무서운 세상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져만 가는 성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성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혹은 "내 친구, 내 가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라는 식의 막연한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국가의 정책이 엄해지면 뭐하겠는가?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는 자세와 태도에도 문제가 있으니 말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성 범죄는 나만이 가지고 있던 '빛'을 잃게 하는 무시무시한 범죄이다. 목숨을 건졌다고 해도, 산 것이 산 것이라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치욕스럽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도, 그리고 나도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전아영: 안녕하십니까, 북한학과 학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선진안전의식에 대해 토론해 볼 거구요, 더 좁게 들어가서는 솜방망이 식의 성범죄 처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연구모임은 마지막 연구모임이 될 예정이니, 모두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쓴 칼럼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수많은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성 범죄자들이 받아온 처벌들을 과연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성 범죄자 처벌 방법으로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가 있지만 실상 이것들은 미리 성폭행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서술해 놓았습니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 범죄”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견해제시와 대처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윤재: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극단적이고 파격적일 수는 있지만 성매매의 합법화, 그리고 성폭행 등 성 범죄가 일어났을 때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닌 도깨비방망이식 처벌로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나 네덜란드처럼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들의 성 범죄율을 참고해주세요. 물론, 0%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선 현저하게 낮다고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처음이니까, 술 마셨으니까 봐줄게’ 이런 식이 아니라, 크든 작든 성 범죄를 저지른 순간 아주 제대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초범이던, 재범이던 그 죄질이 매우 악독할 경우에는 얼굴 사진, 개인정보공개 아주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겐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아영: 1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을 아주 정확히 밝혀주셨네요. 심지어 오늘 연구모임이 진행될 동안, 가장 파격적인 발언을 본인이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내에서의 성매매 합법화라... 저도 정윤재 학우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성매매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그것의 부작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마련되고 안전하게 시행된 후에 실천되어야 하겠죠?

정윤재: 우리나라 사회구조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성'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들이 성 교육을 기피하는 문화와 사상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성에 대한 욕구를 자유롭게 표출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성 범죄들이 더 급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는 이유도, 당장 "내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해서 그런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한 개방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욕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아영: 저와 생각이 비슷하네요. 저도 성 범죄라는 비극을 막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다음 학우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범죄자들은 다 때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국가들이 성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처벌을 한 번 보세요! 물론 정말 말 그대로 때려죽이라는 건 아니고요, 대처방안으로는 무조건적인 무기징역과 화학적거세의 실시가 있습니다. 근데 전아영 학우의 칼럼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화학적 거세가 성 범죄자들의 인권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있죠? 상황이 어찌됐든 모든 인간들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 말이죠. 저는 그들에게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에 가족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면, 그때도 그들의 인권보호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애초에 성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아영: 그렇다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는 입장 자체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한텐 뭐라고 할 건가요?

김이환: 인권도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인간답지도 않은 것들한테 선처를 베푼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답하고 싶네요.

전아영: 김이환 학우의 의견을 듣다보니, 성 범죄자들을 향한 김이환 학우의 분노를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성 범죄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려면, 그들이 이미 망쳐버린 피해자들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이치이지요. 하지만 이미 피해자들의 인권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린 상황에서, 즉 피해자들을 무참히 밟아버린 그들을 인간이라고 불러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다은: 성 범죄자들은 정말 따끔하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특히, 재범율이 높은 성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범죄마저 예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에 저는 물리적 거세든, 화학적 거세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술김에 저질렀다고 하는 가해자들도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안다면, 술김에라도 그런 범죄는 저지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소수라 할 수 있지만 존재는 하는 남성 피해자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해요. 도가니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대부분 성 범죄의 피해자하면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런 편견은 깨져야 해요.

전아영: 김다은 학우께서 제 칼럼의 허점을 잘 짚어주셨네요. 바로 남성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 범죄의 피해자 하면 곧장 여성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이런 것도 한편의 성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의 성별을 떠나 모든 성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대처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김재우 학우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과거 법원이 성 범죄자들에게 내려온 솜방망이 판결은 엄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반영해 성 범죄 법정형 상향이

이뤄진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 사회의 인식은 선진국 대비 성 범죄에 매우 관용적인 편에 속합니다. 성 범죄가 한 여성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인격살인'이란 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성 폭행, 강간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도 큰 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 범죄 억제를 위한 제도들의 재정비가 시급하죠. 성 범죄에 대한 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는, 같은 성 범죄를 수십 번 저질렀어도 법정 최고형의 절반까지만 가중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반면 미국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 등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형 순차집행(consecutive sentence)'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중 범죄의 경우, 각각 독립 된 범죄로 보고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한 뒤 연속해서 집행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복수 피해자가 있는 성 폭력 사건에 대해 판사는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순차집행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 순차집행은 판사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강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징역 수 백년을 선고하는 일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아영: 정말 많은 것을 미리 조사해 와주셨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규정들이 자리 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김재우: 성 범죄 처벌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도 형 순차집행제도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가중 처벌 제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성 범죄에 한해선, 유기징역의 기간 제한을 없애고 법률상 감경 사유를 폐지해 엄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동음란물 배포 같은 관련 범죄 법정형도 대폭 상향시킴으로써 '성 범죄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두순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 성폭행 사건이 터질 때마다 뒤늦게 야단법석을 피우는 일이 반복되어 왔어요. 이제는 선제적인 자세로 성 범죄 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성 범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아영: 굉장히 현실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 순차집행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실현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은 전수정 학우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정: 더 강력한 처벌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성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법률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감형해주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감형해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들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선주: 맞아요, 우리나라의 성 범죄자들 처벌 정도는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저도 전수정 학우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음주상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는 데, 이런 어이없는 경우에 응해주는 우리나라 법률계도 문제예요. 특히나, 실제로 만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누가 억지도 술을 먹인 것도 아니고 본인의 선택으로 마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니, 왜 본인들이 원해서 마신 술 때문에 저지른 실수들을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죠?

전아영: 저도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에 대한의견은 무엇입니까?

한선주: 화학적 거세에 찬성하긴 해요.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전자발찌를 발목이 아닌 눈에 띄는 곳에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저 역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 범죄 처벌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방적 성격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대구여대생 사건처럼 성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시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전자발찌나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성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은 본질적으로 성 범죄자들 스스로가 이러한 짓들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일례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재범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발찌를 차고 신상정보가 공개되니깐 자포자기 심정으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요. 사회교육이나 정신교육 같은 것들을 강화해 이들을 본질적으로 개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형벌강화라는 방법도 있어요. 형벌의 기본적인 목적은 1 차적인 처벌도 있겠지만, 예비 범죄자들이 이것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예방적 기능도 같이 기대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화학적 거세 역시, 오히려 범죄자들을 자극해서 재범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아영: 다른 처벌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 학우들과 의견을 같이 하시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 범죄 처벌방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보다 완전무결한 처벌방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조수정 학우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정: 요즘 매스컴에서는 연일 성 범죄와 관련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 범죄는 인간의 성적 욕구에 기인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발생하는 성 범죄는 오히려 권력형 범죄에 가깝다고 여겨져요. 권력형 범죄란 말 그대로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욕구에서 발현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상대, 즉 피해자를 무력화시키고 또는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싶은 욕구가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요,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주의에 대한 복종 실험〉 입니다. 권위가 있는 상대 앞에서는 어떠한 명령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상대가 무력화되는 과정을 바라보며 쾌락을 느끼는 것은 비단 실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 범죄라는 다른 이름으로 전환되어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권위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아직까지 남성의 권위를 앞세우는 차별적 관행들이 우리 사회의 성 범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권력형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 범죄가 남성에 의해 여성이 피해 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상대가 이로 인해 무력화되는 모습에서 만족을 얻는 모습들은 결국 권위주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들을

걷어내고 정확한 법 집행 아래에서 범죄자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 전환과 법체계의 완비,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구축 등의 여러 방안들을 갖추고 난 뒤에는, 성 범죄로 인해 피해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지금보다는 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는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아영: 성 범죄를 '권력' 이라는 가치에 빗대어 생각해보셨군요. 신선한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강인혜 학우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강인혜: 성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저는 사전예방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서울시에서는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디자인을 이용하였는데 벽면과 계단에 다양한 색감을 부여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어요. 굉장히 미약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성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어둡거나 외진 곳에 운동기구들을 설치, 범죄율이 높은 시간대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출 수도 있다고 해요. 또 어느 칼럼에서 보았는데, 범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밤 10 시에서 새벽 2 시인데, 성 범죄들은 보통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개선이나 도서관 증강, 아니면 SNS 같은 것을 활용한 참여유도 등으로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다면 성 범죄율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아영: 우와, 정말 색다른 대처방안인데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방안 제시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마지막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열띤 토론을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구요. 한 학기동안 귀중한 시간을 내어 모여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②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유나: 안녕하세요 제 5 차 명지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 의견 나눠볼 주제는 〈선진안전의식,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입니다. 나눠드린 발제문, 토론문과 칼럼 등을 읽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내용요약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 들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업: 최근 원전 납품비리가 연달아 밝혀지면서 10 기 이상의 원전이 현재 가동을 멈춘 상태이다. 이 때문에 올 여름 전력 수급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그 위험성이 갑작스럽게 대두되었다. 선진 안전의식은 국민의 안전의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의 기본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과 사기업, 공무원, 관료와 임원의 안전의식 또한 집중적으로 검증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원전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면서 그 검증이 아주 소홀했다. 검증된 부품도 가짜였고 검증서도 가짜였으며 검증업체도 가짜였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사익과 맞바꾼 이들의 행태는 선진안전의식은 고사하고 양심도 없다.

중간에 간단히 정리하자면, 선진 안전의식의 핵심은 '양심'이다. 절차적 편의를 쫓는 태도와 적당주의 등은 선진 안전의식의 정착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요소이다. 민방위, 재난 대피훈련, 화재예방, 현장 안전수칙, 교통 법규 등 전잔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지 않아 과거나 현재나 위험성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양심의 부재 때문이다.

규영: 그 양심을 자리잡게 하는 주요한 방법은 교육을 통한 경험이다. 나도 겪어보았지만 실제로 초중고 학년 단계에서 안전교육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안전의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할 기회도 별로 없다. 초중고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영준: 안전의식의 확립이 나와 우리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경험적 확신을 국민과 공무원, 관료, 임원 모두가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지예: 안전제일이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체감독 및 평가를 안전문화 분야에도 적용이 필요하며, 위협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안전문화 평가를 위한 요약된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학력별, 계층별 교육훈련 제도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각각 개발토록 노력해야 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교육훈련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며 국가과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안전문화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양업: 국민의 안전문화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협회 및 민간 자원봉사단체를 안전문화 활동에 협력토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각 분야별 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안전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안전문화 추진위원회 구성, 안전문화 평가 및 감시활동 등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규영: 학창시절부터 안전교육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70%가 안전불감증이므로 학교에서 소방훈련 같은 걸 하면 아이들이 실제상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미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 소화기 사용법도 한명에게만 알려주고 나머지 아이들에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의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 아이들 한명한명에게 재미가 아니고 진지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예: 연장선상에서 초중고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해봤다.

초중고 모두가 안되더라도 적어도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만이라도 안전교육을 필수로 기간을 정해두고 해야 하지 않을까?

양업: 고등학교때는 입시준비하느라 할 시간도 없으니 초, 중학교 때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나: 네 지금까지 의견 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제가 이번 월례토론회칼럼에서 다루었던 성범죄에 대한 안전의식을 다루어볼까 합니다. 두번째 주제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들 보내드린 칼럼을 바탕으로 준비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데 먼저 지예 학우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예: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있어 미약한 처벌만을 행하고 있다.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마찬가지다.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내려도 실제로 행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삼시세끼 챙겨먹고 편히 생활하고 있다. 국가가 이렇게 말로만 성범죄 근절이라고 하지말고 제대로 엄중한 처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선진국들은 성범죄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영국과 같은 나라처럼 90, 100 년의 징역과 같이 아예 사회와 격리시키던가 사형제를 실제로 시행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성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양업: 사회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법과 국가의 권위가 사회전반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본다. 사회가 올바른 준법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법과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국가가 어떻게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의 피부에 직접닿는것도 없는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대내외적으로 불안감이 없어지도록 더 이상 반인륜적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고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과 시스템을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안겨주어야 한다.

영준: 성범죄의 대다수가 아는사람들로부터 일어난다고 한다. 강력범죄와 연관된 성범죄는 아무리 시스템을 개발해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는 지인으로부터 일어난 범죄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 다른나라의 예를 보면 연령별로 성교육이 정해져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규영: 예방도 중요하지만 재범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대구 여대생 사건도 범인이 아동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나: 그럼 재범을 막기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규영: 전자발찌의 실효성 강화와 신상정보공개 프로그램도 6 개월마다 공개가 아닌 더 자주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영준: 모니터링 인력강화와 같은 방안도 있다.

규영: 그리고 같은 동네에 전단지 같은 신상정보가 온다고 한다. 이게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영준: 하지만 그 범위가 문제되고 있다. 범죄자들 중에 재범을 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텐데 그렇게 신상공개를 해버리면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너무 강하게 그들을 강압하면 그들을 교화하려는 목적이 아닌 외부의 교도소인 것과 뭐가 다른가



지예: 새롭게 법을 만들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현재 있는 법의 문제점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 형법 제 10 조에 있어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죄에서는 일률적으로 형을 감형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신질환과 같이 본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와 음주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경우엔 음주행위자체를 공공의 기초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음주를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요인으로 보는 데 우리나라는 왜 반대로 보는 지 정말 이상하다.

양업: 음주로 인한 범죄는 음주를 한 행위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규영: 우리나라에서 실형을 살지않고 풀려나는 사유가 크게 세가지인데 첫번째가 만취인 심신미약, 두번째가 합의, 세번째가 상당금액의 공탁금이라는 건데 합의 같은 경우는 도가니사건 등에서 보듯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합의가 다반수이고 13 세 이상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합의 하지 않고 보호자가 합의하는 사례로 봐서 합의 여부로 성범죄자의 형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이런 경우는 한 군데도 없다.

또 세번째 그 공탁금은 13 세 아동을 성폭행해도 돈만 내면 풀어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는 유전무죄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양업: 결론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준: 아까 얘기한 재범관리를 호주에서는 풀어줄 때 정신과 상담 후 재범가능성을 발견하면 무기징역을 내린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본다. 초범은 초범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이고 재범의 경우에도 5 년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그렇다고 한다. 재범의 경우라도 빨리 재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규영: 중국에서는 아동성범죄 초범이라도 사형을 바로 내린다고 한다.

영준: 뉴질랜드의 경우 성범죄자를 형기를 마친 후에 위성추적을 한다고 한다.

양업: 싱가폴처럼 참나무로 때리는 태형도 존재한다고 한다.

영준: 또한 피해자들에게 시행할 상담, 심리치료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한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양업: 청소년 성범죄는 법이 직접 처벌을 내릴 수가 없으니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영준: 청소년들에게도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라면 제대로 의식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본다. 강한 처벌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범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양업: 안심귀가 서비스에서도 아주머니들이 데려다 주는 경우가 있는 데 그럴 경우에 아주머니들도 위험하지 않나.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예: 경찰이 데려다주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건 경찰인력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력의 문제가 있다면 공익요원을 그런 쪽으로 데려가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규영: 하지만 이번에 엘리베이터 성추행미수사건이나 대구 여대생 사건의 경우 범인들이 모두 공익을 근무하는 자들이었다. 육사 성폭행 문제도 있고 소방관이 성추행해서 들어간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육사사건도 술 취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다시금 요구된다.

유나: 네 지금까지 학우분들 의견 잘들었습니다. 다들 많이 준비하고 와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럼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본 성범죄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학교에서의 성범죄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성범죄 재범자들에 대한 강한 규제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상담치료 등과 같은 사후의 일처리에 좀 더 신경써야 하고 청소년 범죄라도 계획 하에 혹은 청소년이라는 이름 아래 처벌을 덜 받는 것을 일부러 노리고 실행한 범죄 등과 같은 범죄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와 같이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방이 앞서 선행되어야 하고 재범 방지, 피해자 상담 등과 같은 보완에 힘써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명지대학교 제 5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화 과제 22: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제 85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공현덕(삼육대학교 경영학과)



5월 22일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 85차 월례토론회

5 월 22 일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에서 개최한 월례토론회에서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발제자인 박효종교수는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사고에 대해 기성세대가 과연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에 "빨리 빨리 가느냐"를 따지는 속도감각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인가"를 따지는 방향감각이라는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란 성음유치원원장은 어린이는 가정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배우는 교육이 중요함을 통계적으로 말하면서 유치원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김석언 장학관은 '속도보다 방향', '책임세대, 어른세대' 그리고 놀이를 통해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 등 이 세 가지를 통해 갈등을 줄이자고 했고, 하지연 마포고등학교 교사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미동초등학교에 계신 심재은 토론자는 세대 간 소통이 되려면 기성세대가 하는 권위라는 말의 의미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위'란 권한을 갖고 명령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아랫사람들을 돌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토론자들은 기성세대의 태도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주었습니다.

4 월과 5 월은 새싹이 돋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2014 년은 조금 다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라는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 수 많은 새싹들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저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기성세대의 무책임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을 포함한 선박 관계자들은 승객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구조 매뉴얼은 무시한 채로 먼저 구출되었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슬픔과 애도, 분노와 같은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우리를 휩싸고 있는데, 이러한 슬픔과 애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세월호에서 정말 죄 없이 죽어간 영혼들을 위로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소통 문제에 대한 반성,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변해야 합니다. 개조되어야 합니다.

기성 세대는 우리 사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세대입니다. 이 참사를 통해 기성세대의 개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기성세대가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선장을 비난하고,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재난 구조 활동, 민방위 훈련 등의 활동이 있으면 불평하고, 이러한 사태가 생기면 돌만 던지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보다는 '내 탓이오'라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그동안 자라온 삶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 그에 대한 원인으로는 '빨리 빨리, 싸게 싸게'라는 의식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 이제 속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올바르게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빨리 빨리, 싸게 싸게 가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불러 일으킵니다.

세월호 사고 후 어느 건물에서 에스컬레이터 공사 안내 팻말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수리하겠습니다'와 같은 '빨리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팻말이 붙어왔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고 안전하게 수리하겠습니다'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고,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와 같이 '빠르지 않더라도 확실하게'라는 의식이 기성 세대에서부터 확산되어야 합니다.

② 김민균(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구세대,신세대〉 그리고 〈세대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에서부터,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까지 세대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안전사고이기도 하고, 탐욕에서 빚어진 사고이기도 하며, 돈만 생각하는 '천민 자본주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사건으로부터 새겨야 할 것은 기성세대가 어린 학생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어지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5 월 22 일 (재)선진화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분들과 함께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례토론회 발제자인 박효종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 대해 "지금 국가 공동체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기성세대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해야 옳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성음유치원 김현란 원장은 유치원 교육이 소통의 시발점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서울미동초등학교 심재은 교사는 세대 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이라는 소통의 장벽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학관 김석언 장학관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닌 잘 하는 것에서, 나쁜 놀이에 몰입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놀이를 잘 하는 데서부터 돌파구를 찾고 세대와 세대가 소통하여 바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사회적 지위, 위치에 따른 책임감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 세기 백년전쟁 당시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프랑스의 도시 '칼레'.

1 년 가까이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칼레 시(市)는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왕 에드워드 3 세에게 자비를 구했지요.

그러나 점령자가 제시한 항복의 조건은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지만, 누군가가 그 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도시의 시민 대표 6 명이 목을 매 처형 받아야 한다는 요구였지요.

그 소식을 광장에 모여 전해들은 칼레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죽으려고 자청한단 말인가?” “ 그래도, 그들만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잖아!”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여섯 사람 중 한 사람이 되겠소!” 그는 바로 칼레 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Eustache de St Pierre) 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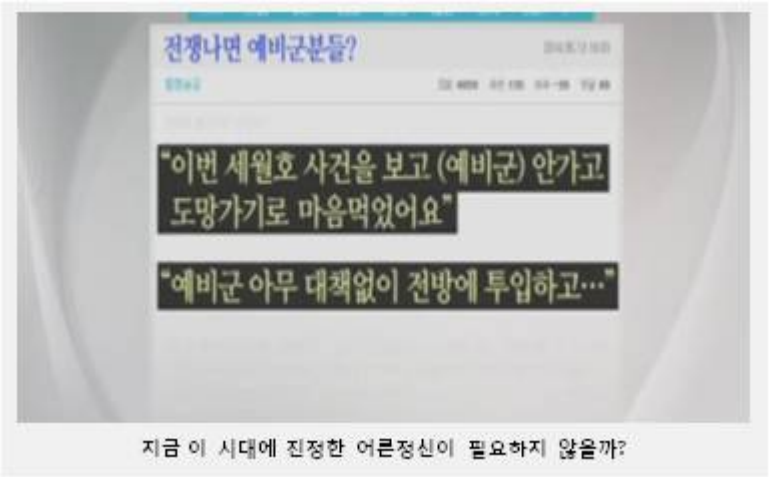
그는 “자 칼레의 시민들이여… 나오라.. 용기를 가지고..” 라고 말하자 뒤이어 교수형을 자처하는 다섯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 상인, 법률가 등 부유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신 죽을 여섯 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칼레 시(市)와 칼레의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그러나 임신한 왕비의 간청으로 죽음을 자처했던 여섯 명은 살게 되며, 이후 이 짧은 이야기는 한 역사가에 의해 기록이 되고 여섯 시민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이 폐지를 줍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던 존경스러운 그들의 자손들이. ‘어떨 때는 선친들께 원망도 더러 생각이 나며, 만주로 망명을 안 갔으면 우리 아버지 앞으로도 땅도 있을 거고 집도 있을 거고..’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들은 독립 운동가의 자손이라는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이 사실에 입각하여 합당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보호받고 존중 받아야 할 독립운동가 자손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이 되니 씁쓸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젊은 청년들의 국가관은 또 어떨까요? 일제치하에서는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 후 분단체제하에서는 남/북 전쟁을 겪으며 이 나라를 지켜냈던 우리의 선조들과 달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전쟁이 났을 때 도망간다', '대책 없이 전방에 투입될 것 같다' 등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현상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국가관을 볼 수 있으나, 세월호로 인해 여실히 드러난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닐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적 위치/신분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희생정신과 상징들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면 어떨까요? 앞의 칼레의 여섯 시민들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인식하는 우리의 의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우리말로 바꾸면 〈진정한 어른 정신〉 정도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른을 진정한 의미로 존경할 수 있고, 진정한 어른들을 일반 어른과 다르게 인식하는 국민들로 거듭난다면 〈진정한 어른 정신〉으로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들과의 세대 간 소통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화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진 출처
사진 1 - http://youtu.be/A3tqZhljuyU
사진 2 - http://youtu.be/4BnBOnH-eOg
사진 3 - http://youtu.be/P-ieXPJHPVI

③ 김수현(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지난 5월 22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월례토론회

최근 '세월호'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로 크게 대두된 사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간의 소통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성세대의 권위 상실 그리고 책임감 부족으로 인한 불신을 갖게된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젊은 신세대들의 무조건적인 반항 또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생각과 의견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신세대의 모습 또한 기성세대의 권위, 책임감 상실 문제와 함께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 월 22 일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에서 개최한 월례토론회에서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문제를 이야기하며 소통의 선진화를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자인 박효종교수님은 기성세대가 과연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며 기성세대의 반성과 변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젊은이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기성세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성세대는 책임감과 희생의 정신을 갖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란 성음유치원원장께서는 어린이는 가정의 거울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배우는 교육이 중요함과 유치원교육제도의 강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김석언 장학관께서는 속도보단 방향, 기성세대의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시며 문화를 통해 만남의 장을 통한 갈등 해소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미동초등학교의 심재은 토론자께서는 세대 간 소통이 되려면 기성세대의 권위라는 말의 의미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권위'란 권한을 갖고 명령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아랫사람들을 돌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대간 소통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과연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소통 부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원인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신세대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과 신세대들의 '어른들은 꽉 막혔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세대 간 고정관념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의 문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모두 서로에 대해 이해하기도 전에 나이가 적고 많음에 따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세대 간 이해가 아닌 오해만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 갈등은 이러한 고정관념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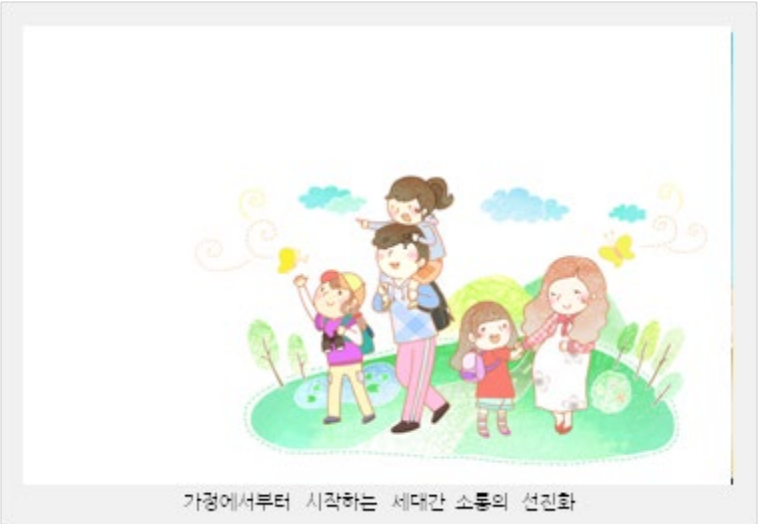
특히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기성세대에 대한 오해가 커지며 이러한 고정관념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의견에 대해 신세대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대간 고정관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 세대 간의 고정관념과 갈등의 심화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의 대화(소통)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사회는 부모와 자녀, 즉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대화(소통) 부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소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가족 간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채 1 시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소통 부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들간의 다툼 또한 대부분 이러한 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오해가 생겼을 때, 이러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 부재로 인해 서로간 오해가 깊어져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문제인 세대 간 소통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작은 사회집단인 가정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소통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나누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정에서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부모가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각종 학부모 모임이나 프로그램도 한국과 달리 퇴근 후 저녁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대화, 자녀의 학습 준비도 높이기, 아버지와의 운동 등 토요일에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새러데이 스쿨(Saturday School)' 등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자녀의 연령별로 부모역할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가정에 제공됩니다. 지역사회와 가족 서비스, 부모를 위한 재정적·물적 지원서비스 등 통합적 가족 지원정책도 제공하며 가족 간의 소통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있다면 우리는 가정에서의 소통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결국은 사회 전체에 있는 세대 간 소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부모와 자녀의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가정에서의 세대 간 소통을 이뤄낸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인 세대간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④ 김희정(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지난 5월 22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월례토론회

얼마 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스마트 폰을 제게 내미셨는데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 한글이 아닌 영어가 나와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해서 따라가기 힘들다며 어색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문명,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20 세기에 접어들면서 100 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역사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입고, 먹고 사는 환경까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생김으로 인해 세대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쌍방향의 올바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난 5 월 22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효종 서울대학교 초빙 교수님은 지난 세월호의 선장을 언급하시면서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고 어린 학생들을 희생시켰다는 죄책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그랬듯이 청소년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된 기성세대가 처절한 자기반성과 자기변화를 통해 변화해야 함을 주장하셨습니다.

김현란 성음유치원장님은 어린 시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올바른 유치원 교육이 세대간 소통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석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학관님은 놀이가 세대간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현재 미동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심재은 선생님께서는 대화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기성세대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짐으로써 세대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좁혀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이신 하지연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교육에서 마련해주어야 하며 규칙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각기 다른 세대를 살아간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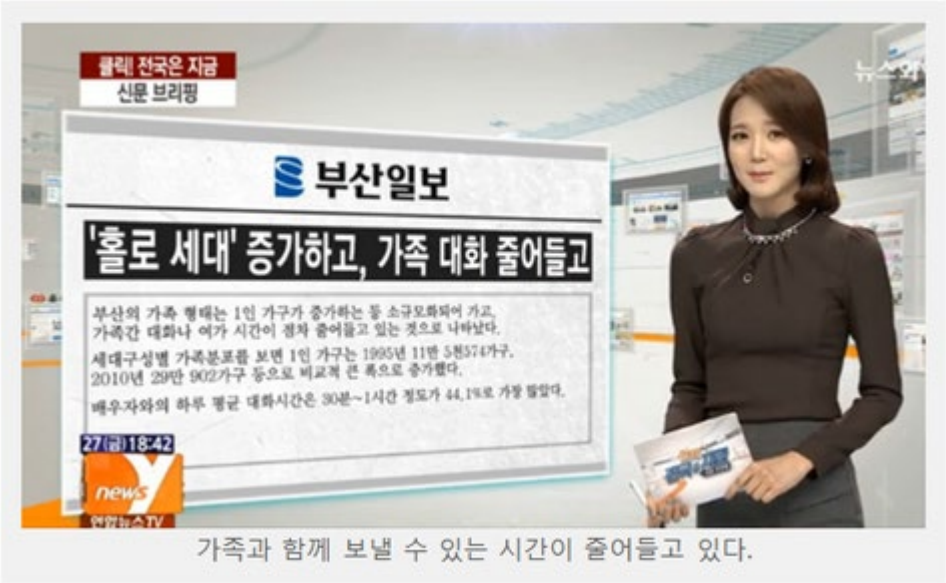
저는 먼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인식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의 여러가지 기능 중 하나인 사회화의 의미는 한 사회의 공통적인 감성과 신념, 집단의식을 새로운 세대에 내면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교육자는 사회화된 인간, 즉 기성세대가 되며 기성세대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더 이상 기성세대만이 교육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셨던 할아버지가 계셨듯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문명을 잘 활용하는 청소년들도 어떠한 측면에서는 현대의 교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가치, 효와 공동체 정신 등은 웃어른으로부터 우리 청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 또한 우리가 기성세대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값진 것들이지요. 즉, 우리 모두가 교육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기성세대와 청소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다릅니다. 옛 것의 우수함이 있고 오늘날의 우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함께 어우르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흔히 세대 간이 모일 수 있는 자리는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일초가 아까운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또한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소통의 부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 바쳐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가르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 단위의 행사를 진행해서 서로의 단결심을 형성하고 그동안 못 다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 준다는 마음자세,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마련, 이 두 가지를 통해 그 동안 소홀했던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노력은 물론, 더 나아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발전은 모두가 서로를 이해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함께 나아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공경하고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http://tvpot.daum.net/v/55398456

⑤ 남아영(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5월 22일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 85차 월례토론회

빠른 시대의 변화로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대 간의 소통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상이지요.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제 85 차 월례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은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박효종 서울대 초빙교수는 기성세대의 권위가 떨어진 현실을 지적하시며 기성세대가 먼저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통해 낮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김현란 성음유치원 원장은 소통의 시작인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어린이교육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소통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심재은 서울미동초등학교 교사는 사회지도층인 기성세대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책임의식을 가진 후 고정관념을 줄이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하지연 마포고등학교 교사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학관은 만남과 소통의 장인 놀이 문화를 건설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다섯 분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도 특히 발제자께서 강조한 권위와 신뢰 상실의 문제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기성세대의 올바른 권위 회복이 세대 간 소통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권위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 소통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통의 시작은 서로가 서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 이해 안에 권위와 신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성세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이야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상호 접촉의 기회를 늘리는 것과 기성세대부터 시작하는 변화의 물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구세대의 접촉점 확대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낮은 지도력 인식 확산,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낮은 지도력의 인식 확산이 요구된다

먼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낮은 지도력에 대한 확산은 1970 년대 이후로 각광받는 변환적 리더십의 개념과 맞닿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관료제 하 권위주의의 맥락에서 벗어나 먼저 솔선수범하고 구성원들에게 권위를 공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참여는 기존의 성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이에는 이러한 지도성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서로 수직적이라는 인식이 큽니다. 특히 이는 학교의 장에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학생인권의 신장을 바탕으로 교권이 무너졌다고 일컫지만 아직도 교사는 학생에게 절대적 우위를 갖고 학생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선진국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완벽히 벗어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비교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서머힐 스쿨은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학교는 높은 성취를 자랑하는데요. 이 안에는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사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학교 내에서 교사는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전교회의에서 성인인 교사와 아동인 학생이 1:1 의 권리행사 능력을 가질 만큼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정말 낮은 지도력으로 학생들에게 교사의 권위를 일부 공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확실히 이와 같은 모습은 심지어 수업 출석에서도 드러납니다. 수업에 출석하는 것이 전적으로 학생의 몫인 것입니다. 다만, 학생이 원할 때는 언제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믿고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세대 간 소통의 시발점이 아닐까요?

물론 이는 결국 상호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누구든 간에 한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스스로의 권위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해 함께 권위를 나누고 신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를 존중하고 합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상호 소통의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상호 소통하는 기회 자체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소통의 선진화 방안이고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빈도 높은 접촉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접촉을 늘려주는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4,000 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민간단체 미국은퇴자협회(AARP;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고 여러 신세대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얻는 등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은퇴자협회(KARP; Korea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역시 신세대와의 소통을 늘리고자 시도 중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단체의 필요성은 적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두 세대 간 서로의 접목점을 늘려주는 것이 비로소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는 정말 기성세대만의 문제도 아니며, 동시에 신세대만의 문제 역시 아닙니다. 결국 이는 두 세대가 합심하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의 장을 늘리고 먼저 신세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기성세대의 리더십이 빛을 발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소통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전술한 두 측면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자유로운 세대 간 소통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로 간의 팽배한 불신이나 과도한 반감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가 비로소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문화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⑥ 배하연(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제85차 월례토론회: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지난 해 겨울, 제가 살던 도봉구에서는 '효축제'가 열렸습니다. 노인 공경과 효에 대한 가치를 바로 세우고 세대 간의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축제였습니다. 창동청소년문화의집부터 새마을 부녀회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데 모여 소통과 나눔의 잔치를 즐겼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노인공경과 효에 대한 가치를 되새겨 보고, 동시에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러한 가치를 '준비된' 축제의 장을 통해서만 느끼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소통의 현주소를 반성하고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가 세대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계층으로 나누어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세대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면서도, 격차를 극복하지 못해 사회 내부의 갈등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지난 5 월 22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세대 간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효종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가 공동체의 개조보다 시급한 것이 기성세대의 개조라고 언급해주셨습니다. 젊은 세대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된 기성세대가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김현란 성음 유치원 원장님은 소통 교육의 시발점을 유치원 교육으로 삼아 이 시기의 교육을 보다 강조해야 할 것을 주장하셨고, 심재은 미동 초등학교 선생님은 기성세대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하지연 마포고등학교 선생님은 기성세대가 배움과 더불어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과 교칙 준수에서 시작하는 학생들의 책임의식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학관님은 놀이가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대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세대갈등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세대갈등의 원인과 객관적 조건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때, 세대차이가 갈등으로 치닫아 소통의 단절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대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세대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대 차이를 계층 의식으로 환원하여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계층 의식으로 전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겠지요.

이러한 원인을 두고 기성세대에게만 그 책임과 잘못을 물을 순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젊은 세대도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세대는 계층 혹은 세대로의 구분이 아닌 개개인이 책임을 가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기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에 대한 개개인의 책임과 도덕성을 묻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교육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시민의식에는 법·규칙 준수, 사회 도덕이나 윤리 의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덕목은 기성세대가 통렬하게 반성하고, 깨우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교육적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확실히 학습하여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요. 즉,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는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책임의식과 도덕성 함양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민주시민의식 교육의 확대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현재 이러한 민주시민의식 교육에 있어 다소 낙후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윤리, 도덕, 법과 사회 등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과목들이 선택과목화되어 가며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 년부터 고교 선택과목 중에 사회, 도덕 등 일부 비슷한 과목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과 교육과정 주요 개정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 입시에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필요 과목의 최소단위 이수 기준으로 바뀌며 역사와 도덕을 포함한 사회과목이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도덕성이라는 가장 기본적 자질을 키우는 것으로 교육은 부정할 수 없는 훌륭한 방안입니다. 윤리, 도덕 등의 사회과 교과가 축소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대 간 갈등 등의 특정 사회문제를 자신의 실제 생활과 비추어 생각하고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를 구성하고 이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민교육이 도덕교과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교과나 교육과정이 따로 구성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덕교과는 '윤리'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여 구성되어있을 뿐,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시민교과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의식 교육

민주시민의식 교육은 학교에서 시행되는 사회과 교과의 확대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두 가지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전 세대를 걸쳐 개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도 분명 실시되어야 합니다.

독일은 시민교육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은 교과 학습을 넘어 평생교육을 통해 올바른 시민 상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각 세대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독일의 평생교육을 단순히 시민교육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민주시민의식 교육 혜택을 누리며, 그 힘이 곧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연방교육원'을 지정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세대 간 갈등에서 자신의 입장과 상대의 존재를 자율적으로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수년에 걸친 시민교육으로 인한 수많은 제반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잘 짜인 제도들은 시민들 스스로 그들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는 시민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주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 역시 학교에서의 윤리, 사회 교육과 이를 넘어선 평생학습이 필요하겠지요.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의식교육의 확대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실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과제들을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 세대 간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배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하는 사회과 교과의 확대와 평생학습의 시행이 시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큰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의 정착

세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세대화합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가 민주시민의식을 갖추고 그 갈등의 실체를 인지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이러한 의지와 더불어 마련되는 교육 제도의 구축을 통한 노력은 세대 간 소통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장,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⑦ 서연우(고려대학교 국제학과)



5월 22일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 85차 월례토론회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기성세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소통의 부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제 85 차 월례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은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박효종 서울대 초빙교수는 추락한 기성세대의 권위를 지적하며, 기성세대가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김현란 성음유치원 원장은 소통의 시작인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심재은 서울미동초등학교 교사는 기성세대가 먼저 모범적인 모습과 책임의식을 가진 후 고정관념을 줄이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연 마포고등학교 교사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배양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석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학관은 현재의 놀이 문화를 개선하여 모든 세대가 어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첫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통은 내가 특정 상대방과 어느 정도의 공감대와 신뢰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이 기성세대와 단절되어, 아무런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겠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감대는 나이를 불문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아버지와의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 당구와 골프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아버지와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많은 대화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가 젊은세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젊은세대의 사람들은 기성세대에게 쉽게 다가서기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유교문화, 나이, 사회적 위치 등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젊은세대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스포츠와 같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자세

이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 또한 소통의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고서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는 젊은세대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직위나 직책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구애받지 않는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고, 배울 점들을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젊은세대도 마찬가지로 기성세대가 새로운 트랜드나 너무 경직된 사고를 지녔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의 풍부한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들임을 감안하여 듣고,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간의 소통의 선진화

소통은 단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서야 하며, 이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⑧ 송경남(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빠른 성장 이면에 숨겨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세대 갈등'

오늘 날 대한민국은 압축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국가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세계경제의 주요 국가로 발돋움 하였지만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성장을 보인 만큼 그것에 따른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들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세대갈등' 일 것 입니다.

이에 (재)한국 선진화 포럼에서는 지난 5 월 22 일 제 8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해결방안을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효종 서울대 초빙교수는 세대 간 소통을 위해 노장세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그 방법 중 하나로 플라톤의 '파이데스테리아' 즉, 소년애의 현대적 윤색을 통해 기성세대의 자기희생과 헌신, 보살핌과 배려의 관계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석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학관은 스포츠와 예술과 같이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즐기고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놀이를 통해 세대가 소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김현란 성음유치원 원장은 뿌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세대 간 소통 교육을 통해 선진화된 세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의 여러 의견 중에서 특히, 김성언 장학관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좋은 일을 잘 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다른 세대가 함께 어울려 잘 놀 수 있는 만남과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와 예술, 문화영역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서로의 세대가 살아온 환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대담론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세대가 기성세대는 젊은세대를, 젊은세대는 기성세대를 틀렸다고 외면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할 것 입니다.

오늘 날 IT 의 발전은 기성세대와 젊은세대를 더욱 구분 짓게 만들었습니다. 'Smart Device' 의 단어 그대로 기기 하나면 생활의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비교적 수월한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와 구분을 짓고,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생활방식과는 다른 젊은

세대들의 방식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의 눈이 비친 스마트 기기만 가지고 사는 젊은 세대들은 불만족스럽기 마련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세대간 소통의 활성화'

따라서 오늘 날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장치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세대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스마트 기기를 역으로 이용하여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 생활하는 가운데 스마트 기기는 세상의 궁금증과 어려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생에서 누적된 경험은 얻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올리고 그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와 같이 국가에서 어플을 만들어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하는 질문을 올리면 기성세대들이 그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기성세대에게서 직접 들음으로써 이러한 소통을 통해 서로가 외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단절된 존재가 아닌, 소통을 하고 인생의 유익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란 그들이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랐기에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대 간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순간,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구분짓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서로가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세대 간의 갈등은 소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⑨ 이성문(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



85차 월례토론회 :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현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권위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세대 간의 불신의 벽이 표면화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번 참사를 계기로 그간 억눌려 있던 갈등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5 월 22 일,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8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한 대책,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박효종 서울대 초빙교수는 세대 간 소통을 위해 노장세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그 방법 중 하나로 플라톤의 '파이데스테리아' 즉, 소년애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기성세대의 자기희생과 헌신, 보살핌과 배려의 관계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석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학관은 스포츠와 예술과 같이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즐기고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놀이를 통해 세대가 소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김현란 성음유치원 원장은 뿌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세대 간 소통 교육을 통해 선진화된 세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포고등학교의 하지연 교사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세대 간에 존재하는 소통의 단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의 의견 중에서도 박효종 서울대 초빙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현재의 기성세대가 솔선수범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기성세대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계층인데, 그러한 권한, 힘에 상응하는 책무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이러한 사회지도층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서양이 아닌 한국 내에서 즉, 전통속에서 그 모델을 찾아보았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모델, 양반의 선비정신

바로, 선비정신입니다. 과거 전근대 조선사회는 신분제가 엄존하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사회를 이끌어 나갔던 것은 신분적으로 상층에 속한 양반 사대부 계층이었고, 이들이 기성권력으로서 주도적으로 국가를 이끌어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양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들이 누렸던 신분적 특권에만 주목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무, 의무도 이행해야만 비로소 양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미야지마 히로시는 그의 저술『양반』에서 조선시대 양반의 성립조건을 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양반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인정받고 있을 것'이라는 조항입니다. 다분히 추상적인 규정인 것 같지만, 확실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즉, 양반들은 그 자신이 양반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상적 기반인 성리학적 이념인 仁에 의거하여 지역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해당 사회에 속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며,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책임을 무시하고 특권만을 누리는 파렴치한 짓을 자행한다면, 지역 백성들로부터 외면받아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많은 양반들은 도덕적인 선비상을 이상으로 삼아, 수 많은 의로운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선비정신의 사례, 경주 최부자

한 해에 흉년이 들면 자신의 창고를 풀어 굶주린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하였고, 나라에 전란이 일어나면 붓을 내려놓고 칼을 들어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였습니다.

때문에 비록 신분제가 존재하던 사회였지만, 그 각각의 신분계층이 각자만의 삶을 살며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기성권위층(양반)이 그 아랫 세대 및 계층을 보살피고 헌신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회층위로서 소통하며 살아갔고, 그랬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사회가 세계 역사에서도 이례적으로 500 년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재 만연하고 있는 세대간의 소통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가 이룩했었던 세대 간 소통의 정신인 선비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거쳐, 오늘날에 되살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대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 기성세대는 그들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고, 새로운 세대도 그러한 정신을 본받아 향후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회 속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2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uWXkql9k1Ps
그림 3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1wOE6C3GsB8

⑩ 이승창(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세대간 갈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각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농업, 아버지 세대는 산업, 젊은이들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세대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5 월 22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분들과 함께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효종 교수님은 기성세대는 권위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성찰을 해야 하며, 세월호 사건을 통해 그동안 미성숙한 세대 정도로 폄훼했던 젊은 세대의 책임감과 영웅적 기질을 보고 기성세대가 배우고 반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현란 성음유치원장님은 유치원 교육이 세대간 소통의 시발점이라면서 유치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은 서울미동초등학교 선생님은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과 더불어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세대 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성언 장학관님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좋은 일을 잘 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다른 세대가 함께 어울려 잘 놀 수 있는 만남과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와 예술, 문화영역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대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은 노인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습니다. 5 월은 가정의 달, 그 중에서도 8 일은 어버이날이지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받는 노인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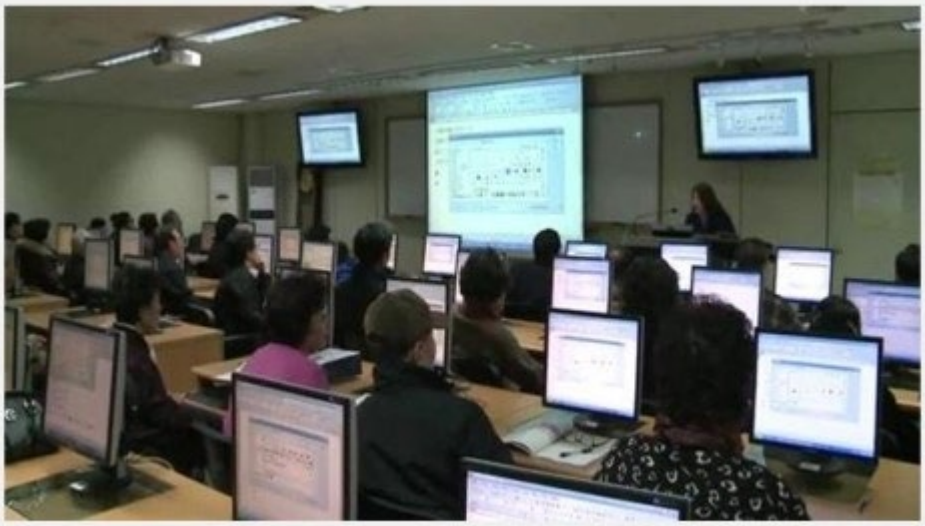
8 일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최근 5 년간 2009 년 587 건, 2010 년 730 건, 2011 년 789 건, 2012 년 979 건, 2013 년 994 건으로 69.3%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상담건수는 2641 건, 2922 건, 3821 건, 5305 건, 5406 건으로 4 년 새 10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학대 현상처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세대 간의 불통, 어떻게 해야 다른 세대와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사회가 좀 더 안정된 구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스마트 전자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젊은이들이 소통해야 합니다. 기성세대에게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컴퓨터에 인터넷까지 하려니 골치 아프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만의 세상이라는 생각에 자식과의 대화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촉진하는 소통의 도구가 오히려 소통을 차단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세대들에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기성세대와 소통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효과성도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르쳐 주는 소통의 장이 확대되어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도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활용한 기성세대 컴퓨터•인터넷 교육

대학은 그 중심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갖추어진 강의시설에 대학생을 활용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수업이 진행된다면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수업을 통해 기성세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에서 기성세대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진다면 젊은 세대의 문화를 접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확보될 수 있으며 젊은 세대 또한 인터넷에서 생겨날 기성세대의 사고와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IT 교육 이외에도 김성언 장학관님의 말씀처럼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세대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젊은 세대들끼리 즐기는 문화와 기성세대 사이에서만 통하는 놀 거리의 구분이 명확해 질수록 세대 간의 소통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구분 없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행사가 최대한 많이 열릴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노력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학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상담원을 확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학대의 이면에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불통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5000 년 전 피라미드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우리 땐 안 그랬는데…'라는 말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세대차이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차이를 소통의 부재때문에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지지 않게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⑪ 정원석(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제 85차 월례토론회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세대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세대차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하면서 세대차이를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세대 간의 차이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시대 변화보다는 세대 간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선진화 포럼이 개최한 제 85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선생님들께서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효종 서울대 초빙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떨어진 현실을 지적하시며 기성세대가 먼저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통해 낮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현란 성음유치원 원장은 소통의 시작인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족 프로그램 등 어린이교육을 바탕으로 한 세대 간의 소통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재은 서울미동초등학교 교사는 사회지도층인 기성세대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책임의식을 가진 후 고정관념을 줄이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연 마포고등학교 교사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도덕, 윤리, 사회(법) 같은 과목들이 단순 암기과목들이 되어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과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학관은 만남과 소통의 장인 놀이 문화를 통하여 기성세대들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도 함께 즐기는 놀이를 통해 세대와 세대가 소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들 중에서 기성세대들의 권위가 떨어진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몇 십 년 전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도 마을 공동체로 생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른들 즉 기성세대들의 권위가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면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이 혼내는 것에 대해 크게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을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는 어린아이를 할아버지가 시끄럽다고 혼내자 아이엄마가 찾아와서 되려 우리아이한테 왜 그러냐고 할아버지한테 소리치는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기성세대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낮추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세대 간 소통으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아이만을 감싸기 위해서 다른 어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낮추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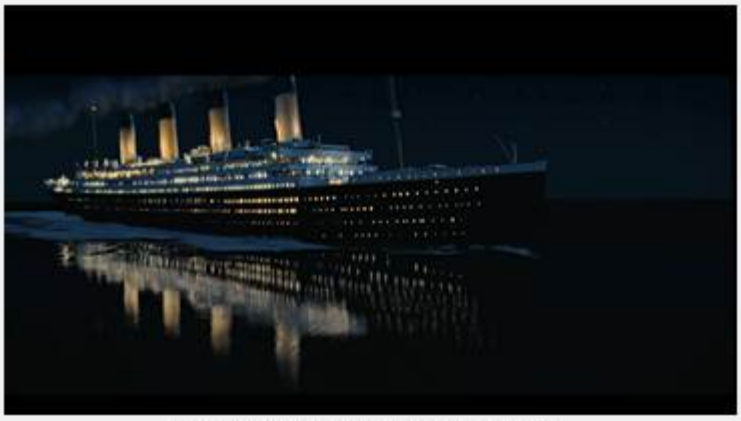


무단 횡단은 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법을 지키는 데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1/3 이상이 아이들을 데리고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아이들에게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기성세대는 결국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과 비슷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권위가 떨어진 리더는 아무도 리더라고 불러주지 않고 따르는 이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성세대의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까요?

첫 번째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봉사의식을 가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불립니다.


탑승객 구출에 최선을 다한 타이타닉 선장

타이타닉호도 빙하와 충돌하여서 침몰하였지만 타이타닉 호의 선장은 여자와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구명정에 구조시키고 배가 침몰하는 순간까지 배에 남아서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타이타닉 호의 선장이 대표적인 서번트 리더십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흉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면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권위가 떨어지는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았는지 나이에 맞는 나이 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젊은 세대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배울 점이 있는 것처럼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에게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도전하는 열정과 끈기 등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권위를 되찾고 존경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따라가며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를 되찾은 기성세대들의 모습 기대해 봅니다.

이미지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6VgOsRVOl1I
http://www.youtube.com/watch?v=PMi1IuSUMX8

⑫ 주연아(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지난 5월 22일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를 주제로 열린 원탁토론회

학교에 통학할 때마다 지하철을 이용하곤 하는 저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은 지하철을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빈번히' 지하철을 타곤 합니다.

워낙 자주 타기도 하고, 한번 타면 기본적으로 1 시간 은 이용하다 보니 이동하는 동안 승객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1 여 년 정도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지하철에 탄 할머니 두분의 대화를 들었던 때입니다.

오랜 시간 서 있다가 자리에 앉게되었던 두분은 의자에 앉으시며 '요즘 젊은사람들은 자리양보도 잘 안해. 버릇이 없는거지. 그래서 편하게 가려면 빈자리에 서둘러 앉는 게 최고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젊은 사람'에 속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예전에 비해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례가 확실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는 두 분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대 간의 갈등과 이로부터 비롯된 소통부재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5 월 22 일, 이와 같은 세대 간의 소통부재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재단법인 선진화포럼에서는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발제자인 박효종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는 세월호 참사에서 기성세대들이 보인 무책임한 모습을 언급하며 "지금 국가 공동체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기성세대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해야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기성세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희생의 정신을 갖춤으로써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김현란 성음 유치원장은 '세대 간의 소통'의 출발점은 '아동들의 인성교육'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주장하며 '유치원에서는 기성세대라 할 수 있는 교사들과 어린 아이들이 서로 포옹을 나눔으로써 진정한 소통을 나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심재은 서울 미동초등학교 교사는 '젊은이들과 기성세대가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이런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포고등학교 하지연 교사는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규칙 준수를 소홀히 하였음을 반성해야 할 것’ 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청소년 및 젊은이들이 미래에는 기성세대가 될 것임을 고려했을 때 학교에서부터 규칙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언 충북교육청 교육부 장학사는 젊은이와 기성세대 모두 ‘바른 놀이문화’ 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대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구와 갈등을 빚어 고민해 본 상황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특정 사안에 대해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은 가치관에서부터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성세대는 ‘공동체 문화’ 에 익숙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함께 하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며 가정 내에서는 ‘가부장적 문화’ 에 익숙한 이들이기도 하지요.

반면 젊은세대는 기성세대가 중시하는 ‘공동체 중심’의 문화보다는 개개인의 삶에 보다 더 충실하고자 하는 ‘개인주의’의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과학기술의 활용에 더 적극적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세대들이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라는 말이 있지요.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함께 있으면 친해지게 된다.’는 뜻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은 다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도 ‘따로따로’ 보다는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통점’을 발판 삼아 함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02 년 월드컵 때는 ‘한국 국가대표 팀’을 응원한다는 것을 공통으로 하여 남녀노소 불문 한국 국민들이 모두 하나되어 응원했던 사례가 있었지요. 이처럼 소통은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젊은이와 기성세대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계기로 같은 ‘취미’ 또는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활성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나 요즘은 ‘키덜트’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몸은 다 큰 어른이지만 어린아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인형’, ‘레고’놀이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불문 함께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이들이 함께 친밀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성세대는 젊은이로부터,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로부터 각자가 잘하는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내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동문 선배님들이 '멘토'가 되고 현재 재학 중인 후배들이 '멘티'가 되어 함께 미래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는 취미로 시작 된 멘토-멘티 프로그램이지요.

멘토선배들은 멘티 후배들에게 현재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무 관련 담당업무와, 이와 같은 일을 위해 필요한 소양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게 됩니다. 멘티 후배들은 젊은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젊은이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멘토 선배들에게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나누기도 하지요.

저의 경우 지난 만남 때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는 선배님께 어떻게 하면 따님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조언도 해 드렸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 년 전에 살았던 키케로는 그의 저서 '노년론' 에서 노년을 '포도주'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포도주가 오래 되었다고 모두 시어버리는 것이 아니듯이' 노년 또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깊은 통찰을 얻게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 힘없고 여린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생명의 싱그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처럼 젊은이들 또한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로 가득찬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기성세대와 젊은이 모두가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통(通)'하고자 하는 진정성으로 다가간다면,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화합'을 이루는 건 시간문제가 아닐까요?

그림출처
자료 2-http://kickofjoy.com/wp-content/uploads/2014/02/generation_gap_by_vitaloverdose-d6ezqvk.jpg
자료 3-http://2.bp.blogspot.com/-Ht9-jlBc-H0/Ujk9KrC0dVI/AAAAAAAACDg/SdStaFzHKN4/s1600/Family+playing+(3).jpg

⑬ 김예진(배재대학교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지난 5월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85차 월례토론회

가족과 나란히 앉아 TV 를 보는 주말이면 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말이지.” 그만큼 아버지는 예전과 지금이 많이 ‘다름’을 은연중에 강조하곤 하셨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가끔씩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면 ‘아 예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한번 쯤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이며 시간의 격차를 탓하곤 합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5 월 22 일,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8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며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박효종 서울대 초빙교수는 과거보다 기성세대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현실을 지적하시며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낮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현란 성음유치원 원장은 ‘아동들의 인성교육’이 세대 간의 소통에 있어 ‘출발점’이라고 주장하였고 심재은 서울 미동초등학교 교사는 사회지도층 자리에 놓인 기성세대가 먼저 책임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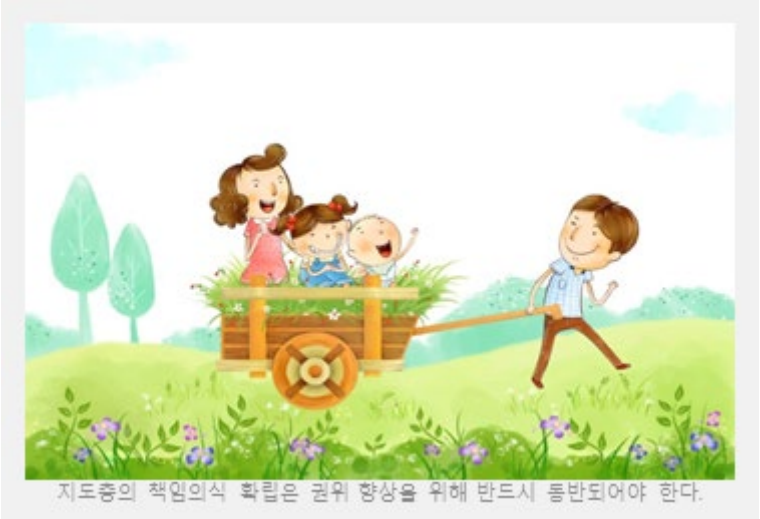
이에 하지연 마포고등학교 교사는 기성세대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제대로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였고 마지막 김석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학관은 만남과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 문화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섯 분의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과거 기성세대가 가졌던 권위와 후세대에게 주었던 신뢰의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서로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효종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사고와 같은 문제들로 기성세대의 권위는

사라지고 후세대에게 그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젖어 지시와 명령만 내리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성세대가 그들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도층의 책임의식 확립은 권위 향상을 위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노력은 바로 책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부모의 세대이기도 하고 선생님의 세대이기도 하며, 사회지도층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는 주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을 버리고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세대들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지도층에 놓인 기성세대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기심을 뒤로 하고 스스로를 희생하여 헌신한 귀족들의 모습처럼 개인의 이득보다는 사회적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큰 결과물이 뒤따르지 않더라도 신세대에게 기성세대의 권위와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기성세대만 노력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신세대가 함께해야하는 노력에 해당합니다.

'기성세대는 보수적인 성향이 많다.' 혹은 '요즘 세대는 너무 예의가 없다.' 라는 고정관념은 서로 간의 벽을 형성해 소통의 단절만을 유도할 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어울림을 형성하려면 고정관념으로 인해 한정된 시각보다는 차이를 인정하는 열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나잇값 못한다.' 라고 합니다. 최근 있었던 세월호 사건은 기성세대의 '나잇값 못하는 행동'으로 비롯된 안타까운 참사이죠.

기성세대는 기성세대 나름의, 또 신세대는 신세대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져야 할 '나잇값'을 제대로 한다면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는 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⑭ 김유라(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5월 22일에 열린 제 85차 월례토론회

“요즘 젊은이들은…”, “젊은것들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라는 말들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들을 어른들이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더욱 더 큰 곳에서 아이들은 어른에 대한 불신을 키워갑니다.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관피아, 어른들의 ‘가만히 있어’라는 말 등 불신이 골짜기처럼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5 월 22 일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에서 개최한 월례토론회에서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습니다.

발제자인 박효종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기성세대가 과연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빨리 빨리 가느냐”를 따지는 속도감각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인가”를 따지는 방향감각이라는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란 성음유치원원장께서는 어린이는 가정의 거울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배우는 교육이 중요함을 통계적으로 말하면서 유치원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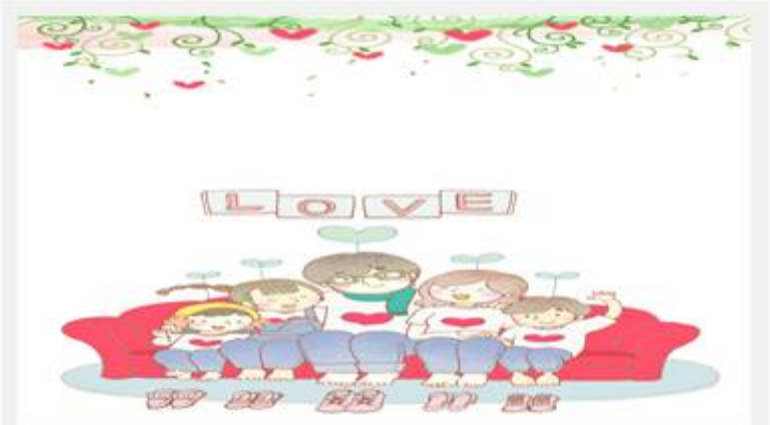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김석언 장학관께서는 ‘속도보다 방향’, ‘책임세대, 어른세대’ 그리고 놀이를 통해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 등 이 세 가지를 통해 갈등을 줄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미동초등학교에 계신 심재은 토론자께서는 세대 간 소통이 되려면 기성세대가 하는 권위라는 말의 의미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권위’란 권한을 갖고 명령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아랫사람들을 돌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토론자께서 기성세대의 태도와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우선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줄 아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인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큰 배려입니다. 그런 차이를 인정해야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갈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SNS 를 통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부터 어린아이까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마녀사냥과 같이 온라인을 악용하지 않고 소통의 장으로 이어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이 속해있는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성 기르기

몇 주 전, 안타깝게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통해 기성세대의 문제점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 각종 비리로 인한 청해진 해운과 관피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김현란 유치원원장께서 하신 말처럼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자랍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아이들의 인성도 모두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별도의 지시를 하여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인성을 올바르게 기를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한 주에 시간을 정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커서 지금의 대학생들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어구들이 익숙합니다. 각종 분야들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하는 한국에서 문화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세대간의 소통을 위한 지름길이다

이런 것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기보다는 젊은 세대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움의 자세를 갖게 된다면 세대 간의 갈등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⑮ 김현경(군산대학교 해양학과)



부모와 자식이 함께 나와 소통하는 프로그램, JTBC 유자식 상팔자

“엄마가 도대체 뭘 알아!”
- 어디서 말대꾸야, 엄마가 그렇다면 그렇다고 알아들어야지!
“됐어, 엄마랑은 더 이상 말 안해!” (문을 꽝 닫고 들어간다.)
- …… 에휴…….

대한민국 역사상 부모 혹은 자식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지 않은 국민은 몇이나 될까요? 아마 전국민이 한 번쯤은 부모님 혹은 자식과 말다툼을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분명히 부모님도 자식이었던 적이 있었고,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텐데 왜 대처하는 방안은 당시 부모님이 하셨던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을까요?

종편채널이 생기고, 많은 방송과 프로그램이 생겨나는 중에 JTBC 에서 방영하는 '유자식 상팔자'라는 프로그램을 가끔씩 부모님과 함께 보곤 합니다. 스타(연예인) 부모님과 함께 자식들이 나와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무척이나 재미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흔히 일상에서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만 평소와 같이 언성이 높아지거나 토라져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중간에 사회자가 의견을 조율해주며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뿐더러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를 거쳤고,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달라져 바로 세대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텐데요. 세대란, 사전적 의미로 아이가 성장하여 부모의 일을 계승하기까지 걸리는 30 년의 시간으로 이야기 하지만, 크게는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의 연령층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부모와 자식을 넘어서서 기성세대와 현세대는 30 년이라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공통의 체험이 기반으로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재)한국선진화 포럼이 주최한 제85차월례회가 지난 5월 22일 열렸다.

이에 대해 지난 5 월 22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제 85 차 월례토론회 주제로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으신 박효종교수는 권위라는 핵심단어를 꼽을 만큼 지금의 기성세대가 과연 진정으로 존경을 받을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셨으며,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성격에 따른 속도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음유치원 김현란원장은 어린이는 가정의 거울이라며, 어렸을 때 배우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통계적 수치를 들며 유치원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김석언장학관은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이야기와 같이 '속도보다는 방향'. '책임세대, 어른세대'를 말씀하셨고, 놀이를 통해 양측 세대 간 만남의 장을 만들어 갈등을 줄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포고등학교 하지연토론자는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규칙 준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청소년 및 젊은이들이 미래에는 기성세대가 될 것을 고려했을 때 학교에서부터 규칙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미동초등학교 심재은토론자는 기성세대가 내세우는 권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토론자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권위는 권한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권위라는 단어만 내세우는 기성세대의 태도와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주신 권위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세대간에 권위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권위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힘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며 대화를 통해 진정한 소통을 할 때에 권위를 내세워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도약을 위해서는 지휘력을 가진 지도자의 통솔이 있었기에 빠른 시간 안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으나, 그 때에는 소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직적인 상하관계만 있었을 뿐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나누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기성세대들은 지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현세대들은 그것을 단지 본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소통의 시작을 스스로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문을 열고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는 측도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양측이 서로 문을 열고 들어오고, 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책임과 인정이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책임을 지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소통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세대가 의견을 나누고 기성세대를 받아들이고 현세대를 나누는 과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공식적으로는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란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을 통해 의식 기반에 책임과 인정의 항목을 심어두고, 떼를 쓸 때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스럼없이 타당한 근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데, 적절성을 판단해보지도 않고 권위만을 내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통에 있어서 기성세대가 내세우는 권위라는 것은 삶에서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 타당한 근거라고 제시하는 현세대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해주며 올바른 책임과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 두어서 각종 사회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하며, 만일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교육이 기성세대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임지는 기성세대, 참여하는 현세대, 함께가는 선진소통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이라 불릴 만큼 세계 순위에서 우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IT 계열과 조선 등 많은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아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 과정을 책임지는 기성세대와 참여하는 현세대가 서로 소통을 통해 발전을 해나간다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youtu.be/nEuBTEWGAX0

⑯ 심성보(공주대학교 공업화학전공학과)



5월 22일 열린 제 5차 월례토론회

저는 평소에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는 편입니다. 버스를 타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양한 세대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저는 아름다운 장면과 불쾌한 장면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란 버스에 어르신이 오르셨을 때 젊은 층의 대학생 또는 청소년이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를 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어르신 분께서는 이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는 모습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불쾌한 장면의 경우는 신체적으로 서 있는 게 힘들어 보이는 어르신이 자신이 앉은 자리 앞에 서있어도 자리를 비키지 않는 청소년의 모습이 이었습니다. 결국 40 대 아주머니께서 먼 자리에서 어르신을 부르셔서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와 신세대 즉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은 줄어들고 있고 서로를 향한 존중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지난 5 월 22 일 열린 5 월 월례토론회에서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박효종 초빙교수는 " '빨리 빨리'와 '싸게 싸게'로 사회 전체를 운영해왔으므로 이번 사고의 공범이 아닐 수 없다.", "기성세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하며, 그 권위는 고대 로마 공화정이 '아욱토리타스의 권위'처럼 끊임없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현란 성음유치원 원장은 "세대 간 소통의 시발점인 유치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유치원은 세대 간 소통의 시발점이라는 국민과 국가의 공감대 하에서 유치원 교육의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유치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재은 서울 미동초등학교 교사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대화가 잘 통하려면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잘 나누는 세상, 공존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기성세대를 통해서 후세대도 배울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하지연 마포고등학교 교사는 "기성세대가 통렬하게 반성하고 깨우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국가적으로 사회구성원 전체가 이 문제를 통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장기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학관은 " 세대와 세대 간 만남이 놀이, 잘 놀아야 하는 부분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놀이는 동일 세대끼리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끄는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권위 상실로 인해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소통 상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과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배울게 없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삼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대부분은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느낀 것처럼 기성세대는 존경을 받고 인정받음으로써 권위를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기성세대가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 속도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수차례 강조가 되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를 이끄는 리더인 부모님들은 자녀가 함께 탑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속도 단속 구간에서만 속도를 낮춰서 운전을 하고 평상시에는 과속을 합니다. 이렇게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기성세대가 절은 세대에게 속도위반에 대한 교육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지키지 않는데 왜 나는 지켜야 하는가?"라는 반항심을 키울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가 기성세대의 권위를 깎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에게 교육을 하기 전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존경을 받으며 권위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진 특이한 성격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측면보다는 나쁜 측면을 바라보고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단적인 예로 들자면, 학생을 살리기 위해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주고 다른 학생을 구하러 선 안으로 다시 들어간 선생님보다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만 생각한 선장의 행동이 훨씬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선생님의 희생이 남긴 기성세대의 참 된 모습보다는 세월호 선장이 남긴 잘못된 모습이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크게 박혔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소한 것부터 즉 "신호 위반, 속도위반을 하지 맙시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서로 서로 돕고 삽시다.","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등을 지켜나간다면 기성세대의 권위가 점점 살아날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권위가 살아나는 것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닫혀있는 소통을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⑰ 장윤석(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제 85차 월례토론회 "세대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며칠 전 부모님과 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공무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공직에서 30 년 이상 일을 해오셔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직장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과 소통이 있었다면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사회를 들여다보면 가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대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5 월 22 일 월례토론회에서는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효종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최근 세월호 사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성세대가 자기반성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김현란 성음 유치원 원장님은 어릴 때부터 배움의 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유치원 교육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심재은 서울 미동초등학교 교사는 기성세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책임의식을 갖고 고정관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김석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학관님은 현재 놀이문화의 개선을 짚어주며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토론자들의 의견 중 유치원 교육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유아기 때 성격과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좋지 못한 교육을 받는다면 성장과정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며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치원 교육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유치원 교육을 들여다 보면 유치원 아동학대, 폭행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세대간 소통의 원활화는 유치원교육 활성화로부터

저는 이러한 유치원교사 교육방법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습위주의 교육은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에서는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의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은 TV 시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에게 “뽀로로 볼까?” 라고 말을 꺼내면 아이들은 매우 즐거워하며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세대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올바른 교육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다면 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 중 많은 대화가 오가야 합니다. 유치원에서의 교육이 사람이 성장하는데 밑바탕입니다. 대화를 통해 교사와 유아들간에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아이들이 겪고있는 고충을 들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명의 유치원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돌보며 대화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루하루 한 두 명의 아이들과 따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치원 교육의 활성화와 기성세대가 먼저 다가가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세대 간의 선진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⑱ 손계준(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현재 우리사회는 '불신'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출처 : 머니투데이)

지금 우리 사회는 '불신'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고, 나아가 세대 간 소통의 흐름은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라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세계가치조사협회(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에서는 세계 50 여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 '일반신뢰'를 측정하는데요, 2013 년 기준 한국은 30 위로, 10 명 중 3 명만이 타인을 믿을 수 있다고 답변한 점은 눈 여겨 볼만 합니다.

5 월 22 일에 있었던 (재)한국선진화포럼 제 85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계에 종사하고 계신 전문가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박효종 교수님은 기성 세대의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며 나아가 젊은 세대를 '동반자 세대'로 간주하여 배울 점은 적극적으로 배워야 함을 지적하셨고, 김현란 원장님은 어른과 아이들 간의 수평적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재은 선생님은 세대 간의 고정관념을 줄이기 위해 차이를 인정하고 기성세대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고 하지연 선생님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과 도덕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공감대의 중요성을 피력하셨으며, 끝으로 김석언 장학관님은 스포츠와 예술을 통한 세대 간의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현실적인 교육의 관점에서 세대 간 소통의 첫 걸음으로 청소년들의 인성과 소통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초 소양과목의 확대와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람직한 교육과 그렇지 못한 교육은 종이 한 장의 의식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유치원에서부터 '더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교육받으며 성장해왔는데요, 그러나 훌륭한 사람의 정의에서부터 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이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릴 적 어른을 공경하며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소위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 왔지만, 상위 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좋은 성적, 좋은 대학'으로 대변되는 결과 중심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과정이 어찌되었든, 나의 성격이 조금 모나도 성공할 수 있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쉬운데요, 이를 바라보는 기성세대들도 '요즘 젊은 세대는 버릇이 없고 자기만 안다.'라며 혀를 차곤 합니다.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2012 년 8 월, 한 리서치업체에서 만 19 세부터 만 50 세 이상 1,000 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대갈등 및 공동체 의식에 대한 조사'가 흥미로운데요, 사람들은 20 대를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세대, 명품을 좋아하는 세대'로, 그리고 50 대 이상은 '배려가 많은 세대, 보수적이고 국가의 세금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 간에 형성된 고정관념과 편향된 이미지는 건강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제고해야 될 사항일 텐데요,

이제 훌륭한 사람의 정의는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불신'으로 깊어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편견은 교육으로 해소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인성교육은 하루아침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고 스폰지처럼 다양한 지식을 흡수하는 청소년들의 교육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왜곡된 교과과정의 수업 시수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가정을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에게 인성과 관련된 덕목을 가르쳐주는 곳은 학교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 사회 등의 수업뿐만 아니라 '창의적 재량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초소양 배양시간을 학교장 재량으로 국영수 수업에 할애하는 현상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수업시수와 내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수정하는 동시에, 기초소양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수업 내용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세대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이 주체가 되는 '멘토-멘티'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세대 간 그릇된 편견을 줄이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대화 시간'을 만들어 각자의 솔직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세대 간의 오해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 없이 발생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불신을 딛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허한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대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세대 간 소통은 비단 '세대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도 판이한 생각들이 존재하듯이,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을 지향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장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⑲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제 85차 월례토론회-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온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세월호의 참사는 성숙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형편 없는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이 사회의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 안에 갇혀 있는 학생들을 구하려 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이 먼저 도망치기 급급했고, 참사 후엔 유가족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기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서로를 헐뜯기 바빴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의 말만 믿고 구조를 기다린 어린 학생들이 모두 희생된 것을 보며 우리는 실망했고 더 이상 기성세대의 말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불신의 대상이 된 기성세대가 추락한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나아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란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효종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는 세대 간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권위의 회복이 필요하며 바람직한 권위에는 ‘봉사하는 권위’라는 분명한 뜻이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권위는 명령하는 사람보다 복종하는 사람들의 ‘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김현란 성음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교육의 정성화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의 길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심재은 서울미동초등학교 교사는 사회지도층인 기성세대의 솔선수범과 책임의식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지연 마포고등학교 교사는 기성세대가 학생들에게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가르쳐야 하며 선진외국의 사례와 같이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김석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학관은 예술과 스포츠 등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건설적인 놀이 문화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제언하셨습니다.

저는 세대 간 소통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로 이 시대의 ‘바람직한 권위’의 부재를 꼽고 싶고 그 해결 방법으로는 박효종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봉사하는 권위, 즉, ‘서번트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실력이 있고 인격이 갖춰진 권위는 합리적이다.’

교직시간, 교수님께서 교사의 권위에 대해 설명하시며 강조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인격이 갖춰진 교사를 학생들이 먼저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태를 볼 때, 우리 사회에 제 분야에 실력을 갖춘 리더는 많지만 훌륭한 인격까지 갖춘 리더를 찾기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정부가 고위공직 후보자 지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에 충족될만 하고 인사청문회 등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을 뽑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정한 도덕적 잣대가 자칫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놓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위공직일수록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청렴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흠집내기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엄정한 도덕적 기준으로 공직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실력과 인격을 갖춘 합리적인 권위가 많아질 때 국민들의 권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세대 간의 진정한 소통 역시 가능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열쇠, 서번트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이번 세월호의 사건은 우리에게 헌신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생사를 다투는 위기의 순간,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탈출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스승들의 희생처럼 학생들 역시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에 있는 어르신들을 먼저 탈출시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내어주는 등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들을 '닮은꼴 사제'라고 보도하며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봉사하는 권위,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는 정직과 성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결여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솔선수범과 타인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서번트 리더십은 지금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기성세대가 솔선수범하여 타인에게 헌신하는 권위,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세대 간의 진정한 소통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를 뛰어 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정체되고 맙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 역시 옳지 못한 어른들의 모습에 낙담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인격자가 되어

솔선수범하고 나보다 남을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서번트 리더십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이것이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더욱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⑳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5월 22일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 85차 월례토론회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들 가운데 보고, 명령 체계의 상식을 넘은 지나친 엄격성으로 상, 하 간에 효율적 소통이 되지 않은 측면이 지적되었습니다.

상부 하달 명령체계는 대하민국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킨 원동력 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 들과의 열린 소통에 대해 둔감하다고 여러 학계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5 월 22 일,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8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한 대책,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박효종 서울대 초빙교수는 세대 간 소통을 위해 노장세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그 방법 중 하나로 플라톤의 '파이데스테리아' 즉, 소년애의 현대적 윤색을 통해 기성세대의 자기희생과 헌신, 보살핌과 배려의 관계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석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학관은 스포츠와 예술과 같이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즐기고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놀이를 통해 세대가 소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김현란 성음유치원 원장은 뿌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세대 간 소통 교육을 통해 선진화된 세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의 의견 중에서도 박효종 서울대 초빙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현재의 기성세대가 솔선수범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상, 하 간 열린 의사소통 시스템 도입처럼 선진국의 성공 사례가 기성 세대들에게도 잘 알려져서 그들이 군대식 위계질서가 만능이라는 생각을 먼저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미국 항공기 사고의 주요 원인들 중 기내 1 등, 2 등 조종사들간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서로 부르는 호칭을 계급을 막론하고 sir 로 통일 시켰습니다.

아울러 사내 회의에서도 이러한 sir 통일 호칭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CIA 의 항공사들 간 사고 발생건수, 매출과 관련한 2012 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2010 년 이래로 사고 건수가 줄었고, 안전하고 합리적 가격의 항공사 이미지로 인해 매출까지 점진 상승을 했습니다.

허브 켈러허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회장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상, 하 간의 지나친 위계 질서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 대화의 단절로 인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결국 매출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성 세대들이 자신들도 엄격한 군대식 위계 질서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가 만능이라는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 이로 인해 발생한 비효율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제 2,3 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성세대들이 먼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성공 사례 등으로 의사소통 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대식의 엄격한 상하 구조 제도 등을 변화 시키는 방법 등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간의 소통의 선진화

㉑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85차 월례토론회 : 세대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른이어서 미안하다”, 지난 30 일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주차장에서 자살한 50 대 남성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믿을 수 없는 참사였고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잃어야 했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어른이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세대 간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5 월 22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5 월 월례토론회에서는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통해 단절된 소통을 회복시킬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님은 현재 우리사회 곳곳에서 선장 역을 맡고 있는 지도층은 보신주의와 기회주의로 연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며, 그 결과로 기성새대들의 공동체 내부에서 크든 작든 ‘세월호’를 기르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김현란 성음유치원장은 세대 간 소통의 시발점으로 유치원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필요성에 대해, 심재은 미동초 교사는 법과 원칙을 솔선하여 지키고 공평하게 적용하여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할 때, 기성세대를 자연스럽게 믿고 따를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연 마포고 교사는 책임과 도덕성을 키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김석언 교육부 인성체육여술교육과 장학관은 세대와 세대가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책임세대의 성찰이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현재의 지도층,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시점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세월호 대참사는 단순히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사고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의 바닥을 드러낸 국가적 위기의 대참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간과해왔던 대한민국 기성세대들의 적당주의, 부정부패, 책임의식의 결여는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을 낳은 세월호 참사는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곪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처럼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샅샅이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은 우리사회에 세대간 신뢰가 부족해서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마치 모두 사라진 줄만 알았던 '어른' 에 대한 믿음과 단절되어버린 줄만 알았던 세대 간 소통의 실낱이 남아있었음을 보여주어 더욱 안타깝게만 느껴지는 우리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을 많은 학생들이 믿었던 것은 "어른으로서의 책임" 을 믿은 것이고, 생사를 오가는 급박한 순간에 '어른'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겐 안도감과 희망의 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책임'을 믿고, '어른들의 말' 을 믿은 것에 대한 결과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모습 뿐이었습니다. 우리사회에 세대 간의 불신이 자리한지 오래이지만 그래도 '어른'이라 불리는 그들을 믿었던 것이고 못 믿을게 '어른'임을 깨닫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세대간 소통 단절은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과 개인주의 팽배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 있어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대 간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기성세대들의 책임의식 강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표적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관료와 정치인들의 책임의식 없는 행동과 그들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을 높인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국가관료나 정치인, 국가 공무원의 범죄에 있어서 더욱 막중한 책임을 묻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법행위는 오히려 단순처벌에 그치고 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범법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다면 기성세대의 윤리기준이 강화될 것이고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들에게 신뢰를 주어 좀 더 바르고 깨끗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 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란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대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진정한 의미의 '어른' 이 많아질 때, 소통의 선진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권인성,김동하, 임형윤, 김영우, 서연우

서연우(고려대학교 국제학부 3 학년):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5 월 22 일 개최한 제 85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공감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서로 접할 수 있는 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접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스포츠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주말에 아버지와 함께 자주 당구를 칩니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더 자유롭게 저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지녔는지, 혹은 세대 간의 소통을 선진화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임형윤(고려대학교 국제학부 3 학년): 저도 공감대가 있어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스포츠로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공통된 취미나 활동도 충분히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고, 저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함께 컨퍼런스에 자주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인성(고려대학교 국제학부 2 학년): 저도 이에 대해 공감하는데요. 공감대를 말 자체가 서로가 어떤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활동이든 취미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소재라면 충분히 무엇이든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재미라는 요소가 포함되면 더욱 좋겠지요.

김동하(고려대학교 국제학부 3 학년): 그러나, 공감대 하나만으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이며,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와 존중이라는 덕목들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같은 동아리나 활동을 같이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서연우(고려대학교 국제학부 3 학년): 스포츠의 국한되지 않는 취미, 활동, 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소재라도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침, 김동하 학우께서 제가 다음에 말하고 싶은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사람 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은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지 한 분씩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권인성(고려대학교 국제학부 2 학년): 신뢰는 쉽게 형성되지 않죠. 특히, 그 사람과 같이 지낸 추억이나 시간이 없다면 단기간에 형성하기는 더욱 더 힘들지요. 그러나, 이것도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쌍방향의 책임의식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으며, 관계가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사람끼리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지켜야 할 부분들을 지켜나가야만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윤(고려대학교 국제학부 3 학년): 다만,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는 형성되기가 어렵죠. 물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우리와 공감하고 같이 지낸 시간이 있지 않은 이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는 물론 현재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자라온 배경이나 경험한 경험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사고방식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되었던 공감대, 신뢰, 존중이라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하(고려대학교 국제학부 3 학년): 하지만, 제가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성격이나 가치관을 굉장히 안정적이며, 일생에서 한 번 형성되었을 경우, 바꾸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이한 가치관을 지닌 두 세대들이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서로를 하나의 개인으로 바라보는 관점

권인성(고려대학교 국제학부 2 학년): 김동하 학우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것이지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김동하 학우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서양 국가들의 개인주의가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어른을 더 배려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의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어른이나 노인들도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이 분들도 젊은 세대를 하나의 사람으로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기성세대와 선진국의 기성세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생각되며,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다면, 상이한 가치관을 지녔어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윤(고려대학교 국제학부 3 학년): 저도 공감합니다. 서양에서는 어른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어르신', '~님'으로 호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나라의 고유 문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의 호칭들이 무의식적으로 상하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우(고려대학교 국제학부 3 학년): 감사합니다. 시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호칭의 문제 등 다양한 부분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의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험 기간 중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이 선진화포럼과 함께하는 마지막 토론이고, 다소 아쉽지만, 여기에서 나누었던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더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②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오상택, 유성렬, 임종호, 정원석

정원석(연대시생 4) :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선진화 연구모임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구모임의 주제는 세대 간 소통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세대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 간의 차이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세대 간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 한국선진화 포럼은 제 85 차 월례토론회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제 85차 월례토론회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월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선생님들은 공통적으로 기성세대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젊은 세대들을 향한 소통을 위해서는 교육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상택(연대사회 석사) : 먼저 정원석 학우의 글에 권위와 존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느꼈던 어른 공경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어른에 대한 공경 즉 기성세대들의 권위를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른공경은 어른들이 가지는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의무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의무가 바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효(연대생화학 석사) : 맞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성세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많이 접하다 보니 기성세대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우리가 알아서 헤쳐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유성렬(연대생공 석사) : 그리고 현재 세대 간 소통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베이비 부머 세대와 에코세대간의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힘든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인 에코세대는 힘들지 않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에코세대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배우기는커녕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에코세대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키운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원석(연대시생 4) : 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구조가 너무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경쟁사회구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세대는 70%이상이 대학에 진학할 만큼 고학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진학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 때부터 경쟁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남들과의 소통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시장으로의 진입에는 더 큰 경쟁이 필요하게 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정년퇴임을 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만을 추구하다 보니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좋은 결과를 낳지만 서로를 물고 뜯는 경쟁은 소통의 단절을 유발하고 세대 간 뿐만 아니라 세대 안에서도 소통이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유성렬(연대생공 석사) :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도덕과목은 암기과목으로 제쳐 놓고 점수를 경쟁하는 수학, 과학이 우선시되는 것이 잘못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도덕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기성세대들과 청소년들이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석(연대시생 4) : 네 맞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먼저 소통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멘토링을 통한 세대 간의 소통

오상택(연대사회 석사) : 멘토링이 그러한 프로그램 아닐까요? 요즘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멘토링,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멘토링이 많지만 이러한 멘토링 보다는 삶의 멘토, 즉 힘든 시기가 있을 때 찾아가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을 인생 멘토로 삼아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제 고민에 대한 그분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서 기성세대들의 의견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삶에 대한 방향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임종효(연대생화학 석사) : 저는 지역의 동호회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지역 축구 동호회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지역 동호회에는 기성세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역 동호회에서도 젊은 세대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운동으로 소통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세대끼리 이해를 할 수 있고 소통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원석(연대시생 4) :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대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기성세대들도 젊은 세대들을 너무 어리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로 기성세대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지금 소통을 통해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미지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_BrFVa-63S8

③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윤용주 이헌호 공현덕 홍미란 여수진

공현덕(삼육대 경영 3) : 지금부터 제 5 차 삼육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토의 주제는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5 월 월례토론회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토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한 선진화 포커스와 월례토론회 전문을 토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웅주 (삼육대 경영 3) : 미국의 경우 신진세대를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인식하고, 기성세대도 이 점을 충분히 받아들여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신진세대에 대해 특별한 존재가치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기존 세대에 대한 보조자 또는 아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미완성자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신진세대가 이끌어갈 것이고, 어떠한 미래를 그려갈 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근본적으로 신진세대에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헌호(삼육대 경영 3) : 네, 하지만 신진세대들은 역사로부터 배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역사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잘못된 점들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길게 본다면 분명 커다란 발전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신진세대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미란 (삼육대 경영정보 3) :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한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주 만나면, 서로 잘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서로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신진세대와 기성세대가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대학교시절까지 졸업 요건 등의 이유로 봉사 활동을 많이들 하는데,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때 어르신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장에 참여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진 (삼육대 경영정보 4) : 네 저는 현재 봉사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이, 확실히 우리보다 오래 인생을 사셨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넓고, 깊이 또한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SNS 상을 통해 어르신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 등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앞서 홍미란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웅주 (삼육대 경영학 3) : 네, 저는 왜 신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소통 부재가 생겼는가를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면 '첨단 기술의 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신진 세대와, 그렇지 못한 기성세대 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기성세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빠르게 적응해가는 젊은 세대가 지식이나 지식보유에서 오는 권위 다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성 세대를 위한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기기 교육 등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공현덕 (삼육대 경영학 3) : 네, 제가 사전에 선진화 포커스와 월례토론회 전문을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론에 참여하신 모두들 토론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을 통한 연구모임은 여기서 끝나겠지만, 앞으로도 종종 이러한 지적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④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이소연, 김원아, 전종욱, 서동진, 심영섭, 김민균

김민균(신방 4) : 지금부터 광운/고려/건국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5 월 22 일 개최한 제 85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였던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대학생인 우리의 관점에서 세대 간의 소통이 원할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까 합니다.

우선 '세대 간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우선 대화의 단절과 서로간의 무관심으로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통 모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원 사이에 응집성이 낮고 이견이 높을 경우에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쓰레기통에 마구 던져버린 쓰레기들이 뒤죽박죽 엉켜서 이상한 모양으로 변화하듯이,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라면 최선은커녕 차선의 정책도 제시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보완 및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지 의견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김원아(식생 4) : 터키의 탄광폭발사고나 영국의 힐즈버러사고를 보면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원활하지 않은 소통인데, 터키나 영국의 국민들은 얼마나 정부에 대해 불신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대대적인 사건사고가 없으려면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한데 국민은 국민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줄 알아야 하고 나라는 나라대로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고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소연(사복 4) : 그렇습니다. 소통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을 언어 그대로 해석해보면 첫째, 서로 상호 간에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둘째,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른 공경지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노년세대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74.9%는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동진(문헌 4) :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낮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노인 공경이 낮은 국가는 국가적 발전에 있어서도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진정한 어른정신〉의 칼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른 정신" 에 굉장히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른정신' 을 '꼰대 정신'과 헷갈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눈높이를 낮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해야 하며 부족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닌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소통이 안 된다면 대화가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세대 간 몰이해가 발생하여 갈등까지 발생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가깝게는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극단적 예이긴 하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패륜 범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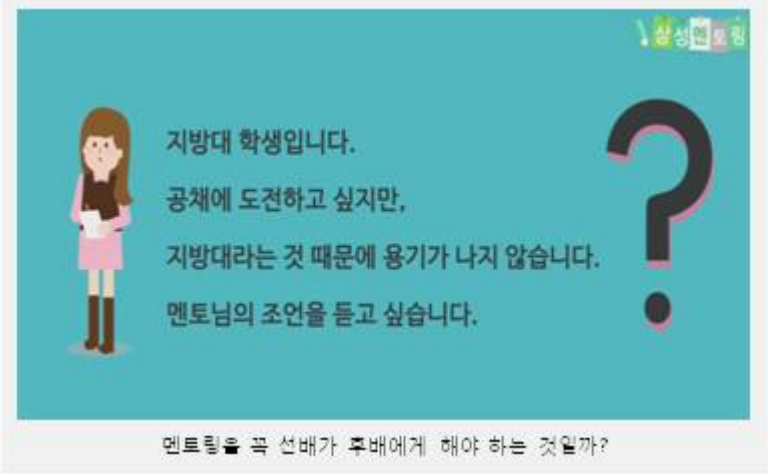
천종욱(경영 4) : 서동진 학우의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촛불시위 등 중고등학생들의 시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편향된 자료를 접하고 또한 이성적으로 판단이 미흡한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평소에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대처도 미흡하였는데요. 그들은 학생들의 불안과 동요를 진정시키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권다툼의 실태만 집중하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저는 그에 발맞추어 청소년을 위한 정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 대한 홀대는 선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표하는 중, 고등학생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에서도 항상 노인 정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고 정책을 편다면 그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을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으로 인지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다 실지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행정 4) : 우선 소통의 본질이란 다르다고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상호 간의 이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해가 발생하다 보니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잘 통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김민균(신방 4) : 그렇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의 선진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디지털 역멘토링이라는 제도를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역 멘토링이란 멘토-멘티가 기존의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기존 멘토링의 반대 개념으로, 일반사원이 선배나 고위 경영진의 멘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소통의 선진화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시하면 어떨까요?

인터넷 시대에 노인분들은 IT 시대의 정보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기기 등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역 멘토링을 하여,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역 멘토링을 실시한다면, 그에 따른 노인분들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멘토링까지 선순환적 연결고리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역 멘토링을 통한 상호멘토링의 추구로 소통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소연(사복 4) : 저는 전공수업의 일환으로 있던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실제로 노인분들과 상담을 위해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과 저희 학생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너희들보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 너희들보다 내가 잘 알아” 라는 말씀들을 흔히들 하시곤 하십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월을 거친 지혜와 혜안은 분명 인정하지만 저희들은 심리적인 상담과 치료를 위해 상담봉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쉽게 인정해주시는 분들을 찾는 것이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심영섭(행정 4) : 대한민국의 수직적 사회 때문에 평등과 협력이라는 것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노인 재 사회화에서도 상담을 받으시는 분만 받으며, 노인 분들 중에 거부감이 큰 사람이 많다고 분석한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디지털 역 멘토링에 대해서도 무용지물이 아닐까요?

김원아(식생 4) : 우선적으로 대학생들에게 토론수업을 의무화하여 소통이란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차차 바뀌어가면서 전국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토론을 통한 소통을 한 사람들은 소통에 깨어있지 않을까요? 당장 우리만 봐도 노인이 됐을 때, 충분한 세대 간 소통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재 사회화에 거부감을 갖는 노인들에게 입장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먼저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현 상황보다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종욱(경영 4) : 소통은 교육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남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지식의 주입에 기울어져 있고 토론을 통한 다른 사람과의 의견 교환하는 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합니다.

교사가 이야기하고 듣는 것에 익숙한 학생들은 남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소통에 의하여 다른 사람과 자신이 다르다는 발상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시대적 환경이 다른 세대 간의 소통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세대갈등을 유발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진(문헌 4) : 우선, 디지털 역 멘토링을 다시 생각해본다면 아주 좋은 취지이지만 위의 이소연학우의 실제 경험담처럼 우리가 먼저 소통에 대해 더 좋은 자세를 취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위의 분들이 먼저 다가오길 기대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이 가장 제일 좋겠지요. 하지만, 그건 정치인들이 알아서 정치를 잘해주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교육을 통한 소통을 발전시키고, 타인의 입장. 즉, 노인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역 멘토링은 잘 이루어질 것이고, 그 멘토링 기간에 상호 멘토링도 자연스럽게 유도되리라 봅니다. 결과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도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민균(신방 4) : 지금까지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소통에 대한 현 상황을 짚어보았으며, 해결책으로 디지털 역 멘토링을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역 멘토링을 실행할 때의 문제점들은 교육을 통해 소통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역 멘토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한 상호 멘토링을 통해 소통의 선진화도 이루는 선순환적 구조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그로 인해 오해가 생기지 않을 때, 그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제 4 차 광운/고려/건국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출처
사진 2 - http://youtu.be/VfBuu-4jRjs
사진 3 - http://youtu.be/1BDga3A4noM
사진 4 - http://youtu.be/_BrFVa-63S8

⑤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김희정, 한정원, 이슬기, 박연신, 오누리, 김다선, 송 현, 김해리, 한은주

김희정(영문 2): 지금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의 주제는 지난 5 월 22 일 한국선진화포럼에서 개최한 월례토론회 주제였던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입니다.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우리사회는 예전보다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도는 급 하락했는데요,

한 사회를 함께 발전시켜나가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활발한 소통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저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세대 간의 소통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학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오누리(영문 4): 김희정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각기 다른 세대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은 함께 사는 소규모의 집단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세대 간의 소통이 시작된다면 보다 거부감 없이, 빠르고 실질적인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다선(영문 3): 오누리 학우 말씀대로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익힌다면 이것이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웃어른들께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집에 계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생각나 행동을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송 현(영문 4): 가족 내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분명 사회에 나가서도 어른들을 대함에 있어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양로원에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을 돌보아 드리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확실히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친구가 더욱 어른들과 편하게 말하면서 자신 또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은 말을 꺼내기 조차 불편했는데 말이죠.

한은주(영문 4): 물론 가정 내에서 활발한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회의 전반적인 세대 간의 소통에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가족들과 한 끼 밥 먹는 것조차 어려운 이 시대에 과연 가족들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희정(영문 3): 많은 학우 분들께서 가정에서 시작하는 세대 간의 소통이 나라 전체 내에서 세대 간의 소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혜지 학우 분 말씀대로 현재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시간은 물론, 함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가족에만 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연신(영문 3): 맞습니다. 사회에서 바쁜 일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먼저 가족 내의 소통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가족 여행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딱 짜여진 코스에 단체로 몰려다니는 여행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여행상품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가족들에게 기호에 맞추어 여행코스를 짜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양프로그램 같은 것을 기획해 방송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원(영문 2): 저는 기업차원에서 또한 가족 내의 소통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가족 단위의 행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내에서 새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연령이 공존하고 있는 회사 내에서도 이러한 소통 능력은 회사 자체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를 둔 친구가 있습니다. 봄, 가을 쯤이 되면 기업 자체에서 가족 전체를 불러 문경세제를 따라 한 바퀴 돌고 또 게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친구는 이번에도 또 가야 한다고 투덜댔지만 그 모습이 정말 싫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소풍 내내 함께 가족과 있을 테니 분명 함께 얘기할 시간도 생길 것이고 즐거운 추억도 쌓으면서 이렇게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스토리텔링 형식을 통해 투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능프로그램

김해리(3): 저는 언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가족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현재 많은 예능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얼마 전 6.4 선거를 맞아 무한도전에서는 멤버들을 후보자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미래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투표를 하자는 메시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능프로그램에서 가족놀이, 가족문화, 가족회의와 같은 소통의 장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희정(영문 2): 가족의 소통 활성화 방안으로 많은 방법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을 캠페인을 통해 알리고 또 맞춤형 가족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또한 가족단위의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기업에도 좋은 문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능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 형식을 통한 메시지는 많은 가족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 문제를 저는 가족 간의 소통에서 먼저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한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소 공동체이니 만큼 그 사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기업, 언론 등 모두가 협력해야만 가족 간의 소통, 더 나아가 세대 간의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http://www.youtube.com/watch?v=xAzR4V0zVTE

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이보람(교육학 4), 서유진(교육학 4), 김현아(교육학 4), 최경원(교육학 4), 남아영(교육학 4)

남아영(교육학 4) :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5 월 22 일 개최한 제 85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성세대의 권위와 신뢰 회복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신구세대의 상호 접촉 기회 확대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낮아지는 지도력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소통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통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권위와 신뢰의 전제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최근

지도성 이론에서 유명한 Burns(1978)의 변환적 지도력(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확산과 신구세대의 접촉점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유진(교육학 4) : 저는 로버트 그린리프의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대해 많이 고민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교생에 나갔을 때, 교감 선생님께서 서번트 리더십을 직접 행하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등교 지도를 하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나서서 인사를 시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90 도로 인사를 하시는데 그 이유를 여쭈어봤더니 자기가 먼저 숙여야 학생들이 이를 따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보며 먼저 낮아져야 한다는 말에 크게 동감하였어요. 실제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많이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낮아지는 지도자의 모습과 학생들을 위한 활동,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권위는 이러한 형태로 드러나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이보람(교육학 4) :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의에 대해 보다 명확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서번트 리더십이 무조건적으로 지도자가 낮아진다고 보기보다는 같이 지위가 동등하게 상향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도자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상하의 구분이 명확하다고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함께 발전하는 방식이라고 보아야만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변환적 지도력의 확산에 대해 논의하는 교육학과 학우들

최경원(교육학 4) : 서유진 학우의 말을 덧붙이자면 제가 교육실습을 했던 학교는 교장선생님께서 수요일마다 하이파이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학생들과 함께 소통함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본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모습, 즉 솔선수범하시는 것이지요.

솔선수범에 대한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교생 때 제가 먼저 쓰레기를 주웠더니 아이들이 모두 따라 하더라고요. 먼저 올바른 모습을 보인 후 할 수 있는 업무를 구성원들에게 잘 배분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이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이고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게끔 유도하고 주인의식을 길러주는 것이지요.

김현아(교육학 4) :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풍토와 문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단순히 한 사람만의 변화를 통해 전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경원 학우의 경험도 어쩌면 이미 학교 내 그러한 분위기가 퍼져 있었기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공유된 풍토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서유진(교육학 4) : 물론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확실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시대고 그 방향은 잘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0 년대 이후 변환적 지도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기존의 학생들을 경쟁과 효율이 중심이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자체는 매우 올바르다고 봐요.

따라서 기성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추세를 교육에 있어 문화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학생의 수직적이고 순종적인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룩하고 그로 인해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보람(교육학 4) : 수평적 관계의 강조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라면 카리스마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세대 간 소통에 있어서도 평등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이끌어나가는가가 중요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기성세대가 인간적 매력이 빛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개념도 교육을 통해 충분히 발달이 가능하고요.

또 이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신세대에게 권력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해 모두의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역할을 배분해주는 것이죠. 영국 서머힐 스쿨(Summerhill School)의 경우도 교사가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선택의 주체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서번트 리더십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영(교육학 4) : 여러분들께서 리더십 이론을 중심으로 정의를 명확히하여 이러한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보람 학우가 제시한 서머힐 스쿨과 같은 사례가 보다 퍼져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 학생인권의 신장이 교권 붕괴와 맞닿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처럼 수직적인 관계를 이미 상정해 놓다 보니 그 프레임에 매몰되고 결국 소통의 어려움이 더 커진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변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신구세대의 소통의 장을 제시해주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대 간의 소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경원(교육학 4) :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들으며 학교를 떠올렸는데요. 가치를 주입하기도 하며 동시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니까요. 학교와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모여 있는 장소에서 상호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적 여건을 개발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보람(교육학 4) : 물리적인 장을 열어주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먼저 정신적인 구심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함은 사실이죠. 하지만 막상 이를 제시하여도 어떤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치와 비젼이죠. 어떤 걸 중심으로 두고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신적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최경원 학우가 말했듯 학교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같이 정신적 측면에도 충분히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모두 관여하는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유진(교육학 4) : 이보람 학우가 말했던 공동체의 공통된 합의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직'이라는 덕목이 이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진시민의식에서도 정직이 꼽히듯이 정직이라는 가치는 사회 안에서 무척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기타 여러 기관에서도 정직이라는 덕목을 실현하려면 과정을 평가하고 직업적으로도 윤리의식이나 책임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올바로 하지 않고 떠넘기기 등의 문제를 낳기 때문이지요.

남아영(교육학 4) : 저는 앞선 이야기를 들으며 정신의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특히 선진국의 경우,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접촉을 늘려주는 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경우 4,000 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민간단체 미국은퇴자협회(AARP;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세대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얻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병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은퇴자협회(KARP; Korea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단체에서 대학생들과 기성세대와의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퍼지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고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신세대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김현아(교육학 4) : 기성세대에 대한 전문성과 그 노하우나 경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가진 전문적인 권위에 대한 인식보다는 기성세대는 '권위주의적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요. 그저 고리타분한 이야기라는 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6.4 지방선거를 보면 실질적인 20 대 투표율이 늘 그렇듯 낮은 수준이었어요. 말은 많지만 관심을 제대로 갖지 않는 것이지요. 제 주변에도 기권을 하겠다고 투표를 안 한 친구들이 많은데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우선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두 세대의 한꺼번에 변화되어야만 바뀐다고 생각해요.

이보람(교육학 4) : 소위 말해 어른들만의 리그가 된 이유에는 우리가 계속 논의했듯 기성세대의 문제가 크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어요. 신세대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되는 느낌 역시 존재하거든요. 최근 제

고향에 이번에 30 대의 후보가 군수로 출마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30 대가 무슨 군수냐며 뽑아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이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현아 학우가 말했듯 기성세대와 신세대 둘 다의 변화가 필요하고 먼저 기성세대의 인식과 문화 역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연스레 기성세대의 문화가 답습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역감정의 존재인데요. 이번 교육실습 때 아이들이 이를 물어볼 정도였어요.

서유진(교육학 4) : 저는 들으며 생각한 것인데 가정 내의 부모님과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신세대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기성세대는 부모일 텐데요. 부모와의 소통 역시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잖아요? 저녁문화, 소위 말해 밥상머리 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풍토 조성과도 연관성이 있으니 먼저 가정에서부터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보람(교육학 4) : 맞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엄격한 구분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만 보아도 교무실과 교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구분되어 있어요. 그 분위기로 인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교무실과 교장실 출입을 꺼리게 되고요. 이러한 문제를 분명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번 수학여행이나 해경의 폐지 같은 부분을 보면 지나치게 피상적인 결과만 추구하는 듯한 인상도 자아내요. 근본적인 접근을 위한 노력과 하향이 아니라 상향으로의 의식 개편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아영(이화교육 4) :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권위와 신뢰 회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하여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변환적 지도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올바른 정의 확립과 실례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되었고 둘째로, 먼저 솔선수범하는 기성세대의 모습과 신세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해주셨습니다.

셋째로, 이를 위한 풍토와 문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현장에서 문화를 자리잡게 하는 방안을 이야기하셨으며 넷째로, 기성세대가 인간적인 매력이 빛나는 카리스마를 보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사가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머힐 스쿨 사례와 같이 실생활에서의 권력 공유 경험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이루어진 신구세대의 상호 접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로, 학교와 같은 기관을 활용하여 상호 의견 교류를 위한 시스템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으며 둘째로, 물리적인 장과 동시에 가치와 비전 공유를 바탕으로 한 정신적인 구심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은퇴자협회(AARP;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와 같은 단체를 활용하여 소통의 기회를 늘려주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그 외의 방안으로 첫째로, '정직'과 같은 덕목을 바탕으로 가치 공유를 확산시켜야 하며 윤리의식과 책임감 강조하는 분위기 형성, 둘째로, 젊은 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 기성세대의 전문성과 노하우, 경력 등을 인정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로, 신세대에 대한 평가절하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어 넷째로, 기성세대와 신세대에 대한 지나친 구분을 줄이고 다섯째로, 밥상머리 교육과 같이 먼저 가정에서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기성세대와 신세대,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과 소통의 장을 늘리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해결방안보다는 여러 의견을 교류하는 데에만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미흡하지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연구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⑦ 성균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김수연, 이명은, 이재현, 안예은, 배하연

배하연(교육 3): 성균관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 월 22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주관하여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의 주제인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이 젊은 세대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된 기성세대가 자기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개혁해야 하고, 반대로 젊은 세대 역시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통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더불어 세대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대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세대갈등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세대갈등의 원인과 객관적 조건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때, 세대차이가 갈등으로 치달아 소통의 단절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저는 세대갈등의 원인을 세대 차이를 계층 의식으로 환원하여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계층 의식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규칙 준수, 사회 도덕이나 윤리 의식 등이 포함된 민주시민의식의 교육이 개개인의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현재 이러한 민주시민의식 교육에 있어 다소 낙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통한 세대갈등 극복 방안에 대해 학우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예은(교육 3): 저 역시 배하연 학우가 말한 것처럼 세대 갈등의 원인이 각 세대 간의 차이를 계층의 차이로 인식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세대 갈등은 어느 한 세대의 통렬한 반성과 깨우침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범국민적으로 세대갈등의 극복 가능성을 분명히 인지할 때 이 역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각각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함양하여 서로 간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 차원의 교육만큼 확실한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의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세대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신구세대의 토론회도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봅니다. 요즘 세대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데도 정작, 직접적으로 신구세대가 만나 이를 고민해 보는 경우는 잘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김수연(교육 3): 저 역시 안예은 학우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인데요. 정작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시민의식 교육은 계속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리, 도덕, 법과 사회 등의 사회과 과목에서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교육현장의 경우를 보면 사회과 과목이 점차 선택과목화 되어가면서 축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마저도 통·폐합을 통해 과목과 시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리, 도덕 등의 교과가 축소되는 것은 어쩌면 세대갈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시민의식의 덕목을 기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프랑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학교 교육과정에 시민교과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랑스의 본 프로그램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은(교육 3): 저도 김수연 학우와 마찬가지로 현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민교육이 도덕교과에만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학생들이 주목해서 볼만한 별다른 교육과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요.

더군다나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덕교과는 '윤리'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역할이나 책임을 인식하게 만드는 내용은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의 효과가 좋은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민성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회문제를 자신의 실제 생활과 비추어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회적 갈등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의식 교육

이재현(교육 3): 앞서 학우분들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의식교육에 대해서 언급해주셨는데요. 저는 학생을 제외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재교육 방안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사회에서 개개인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미라는 요소를 첨가하여 생활 잡지나 TV 프로그램에서도 세대 간 갈등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사회의 시민교육을 돌아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실제적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론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법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요.

실제적으로 세대 간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TV 공익예능을 통해서 혹은 공익광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학생들을 포함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배하연(교육 3): 이재현 학우의 말처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에 대한 방안도 분명히 탐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시작하는 근본적 시민의식 교육은 장시간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자극적이고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TV 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세대갈등 극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모든 학우분들이 세대갈등 극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에 대해 입을 모아 찬성해 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교육의 대상으로는 크게 학생과 일반 시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교육뿐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적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의식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선진화포럼이 진행하고 있는 월례토론회 등의 직접적 소통의 장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사회과 교과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프랑스의 경우가 우리사회의 교육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시민교과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우분들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도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힘을 이용하여 실제적 방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전 세대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의 힘을 빌린 근본적 해결책과 더불어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명은(교육 3): 저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기성세대의 권위 상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적 이슈들을 통해서 기성세대 즉, 어른들의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행태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세대갈등의 문제를 어느 한 쪽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기성세대의 권위 회복을 위한 방안이 동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SNS 를 통해서 민주시민의식을 앞장서 실천하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감동과 통찰을 주기도 하는데요, 언론이나 SNS 에서 부정적인 사례를 부각하기 보다는 긍정적 사례를 노출시켜 젊은 세대들의 귀감이 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올바른 교통법규 준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지키기 등은 젊은 세대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성세대의 권위는 젊은 세대들의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의 성장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수연(교육 3): 저는 각 세대에서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갈등이라는 것이 기성세대의 일방적 잘못에서 빚어진 다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사상이 이를 뒷받침할 좋은 교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사상에서는 '중용'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용은 균형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갈등의 긍정적인 의미를 살려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의 중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깨닫고 나름의 책임의식과 도덕감정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갈등을 넘어 중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현(교육 3):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갈등 극복을 위해서는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직접적 소통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의 장은 접근하기가 쉽다는 점에서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사회적 사안들에 대한 신구세대의 서로 다른 의견을 즉각 교환하고 공감함으로써 각 세대 간 간극을 좁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명제로 운영하여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소통을 계속하다 보면 그 합의점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고민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


배려를 통한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안예은(교육 3):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나이 어린 친구가 노약자를 배려하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장면들을 보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소통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물론, 세대갈등을 위한 교육적 차원, 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이해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하연(교육 3): 오늘은 세대갈등 극복을 위한 민주시민의식교육의 역할과 더불어 세대갈등 극복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것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학우분들께서는 제도적 차원, 정의적 차원에서의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는데요. SNS 나 언론을 통한 기성세대의 권위 회복하기, 온라인상의 소통의 장 만들기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중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교육원'을 지정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세대 간 갈등에서 자신의 입장과 상대의 존재를 자율적으로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시민교육기관의 구축은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들의 의식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더없이 훌륭한 교육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는 시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실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고민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하는 사회과 교과의 확대와 평생학습의 시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대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세대화합은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가 그 갈등의 실체를 인지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시행하여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제 4 차 성균관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이승창(경영3)박장수(경영3)신경도(경영3)김예지(미술3)이영조(경영3)김보경(경영4)

이승창(경영 3) : 지금부터 성균관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5 월 22 일 개최한 제 85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IT 기술의 보급이 잘 되어 있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기술이 Web 2.0 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온라인상의 소통이 활발한 때입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온라인 상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면 어떨까요?

김예지(미술 4) : 온라인을 통해서 세대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대학에서 기성세대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움으로써 온라인상에서 기성세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도(경영 3) : 하지만 컴퓨터를 어려워 하고 기피하는 기성세대에게 사회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성세대가 가정에서 자식이나 손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컴퓨터 기술을 가족들에게 배운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창(경영 3) : 온라인상에서 세대 간의 소통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기성세대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거론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대학이라든지 기존의 대학시설에 갖추어진 강의시설을 기반으로 대학생이 참여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혹시 오프라인에서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보경(경영 4) :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음악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계층이 참여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졸업한 선배님들과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대구분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활동을 통해 소통의 선진화를 이루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박장수(경영 3) :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세대 간의 소통을 증진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봉사활동단체를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외활동 등 기업이 후원하는 봉사활동 단체는 대학생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신에 봉사활동 단체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봉사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창(경영 3) : 오프라인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문화적 활동을 통해 그리고 봉사활동 단체의 구성을 폭넓은 세대로 확장시킴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영조(경영 3) : 저는 온, 오프라인에서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감정적 교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성세대는

시대가 변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젊은 세대를 인정하며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장수(경영 3) :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간의 다름을 먼저 인정할 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 서로에게 배울 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워야 합니다.

이승창(경영 3) : 그렇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때도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서로를 챙기고 노약자부터 배려하는 모습은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승창(경영 3) : 오늘은 세대 간 소통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았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모두 여러 가지 방법이 얘기되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세대 간의 소통이 증진되기 위해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기성세대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상에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문화적 활동과 봉사활동 등의 단체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세대 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울 점을 배우고 수용하는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애들은 이래서 안돼', '어른들은 말이 안 통해'와 같은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할 때입니다.

서로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들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정화된 사회구조를 가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미지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26KbXK3T-Ls

⑧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신재연, 오혜린, 이은경, 이덕주, 홍상범, 이찬열

송경남(경영 4):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지난 5 월 22 일, 제 8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통해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 단순히 서로의 세대가 살아온 환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대담론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세대가 기성세대는 젊은세대를, 젊은세대는 기성세대를 틀렸다고 외면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진화 연구모임은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경남(경영 4): 오늘 날 IT 의 발전은 기성세대와 젊은세대를 더욱 구분짓게 만들었습니다. 'Smart Device' 의 단어 그대로 기기 하나면 생활의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비교적 수월한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와 구분을 짓고,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생활방식과는 다른 젊은 세대들의 방식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의 눈이 비친 스마트 기기만 가지고 사는 젊은 세대들은 불만족스럽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 날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장치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세대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스마트 기기를 역으로 이용하여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포털사이트에 질문을 올리면 답변을 해주는 기능 처럼 하나의 어플이나, 사이트를 국가에서 개설하여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을 수 없는 인생의 경험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다는 것 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조언을,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을 설명해줘도 좋구요. 이로 인해 서로가 단절된 존재가 아닌, 이어져있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윤경(아동 3):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스마트 기기인데 이것을 역으로 활용하여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모두 너나할 것 없이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PC 등 스마트 기기 하나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세대 간 소통을 이룰 수 있다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손바닥에 있는 작은 기기 하나로 소통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기기에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쉽게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SNS 의 사용 연령층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의 장이나 학교 동문회 등과 같은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나 문화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덕주(행정 3): 젊음 세대와 기성 세대가 쉽게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버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은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은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악성댓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통을 위한 SNS 공간이 젊은 세대들의 무분별한 글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SNS 를 활용하여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소통의 장이 아닌, 서로의 세대 간의 진솔한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멘토와 멘티처럼 세대 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혜린(아동 3): 저는 이덕주 학우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단순히 SNS 를 소통의 장으로 형성한다고 해서 세대 간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무분별한 참여가 아닌 SNS 활용 초기에는 국가에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먼저 선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덕주학우가 이야기한 멘토, 멘티의 개념을 도입하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관계를 국가에서 정해주어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재연(경영 3): 저는 약간은 다른 생각입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서로가 단절된 것이 아닌 연속된 것이라는 송경남 학우의 말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관계를 국가가 설정하고 제안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여건만 제공하고 서로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준한(경영 4):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SNS 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부모님 세대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단순한 메신저만 활용할 뿐 SNS 와 같은 스마트 폰의 다른 기능은 젊은 세대처럼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SNS 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성세대들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법이나 SNS 사용법, 인터넷 의견교류와 게시판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IT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이찬열(법 3): 저 또한 이준한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IT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에게 직접 스마트 기기 활용을 가르쳐주는 방법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이나 구청, 또는 대학교에서 기성세대들을 초청하여 스마트기기 및 IT 활용 강좌를 열고 젊은 세대들이 직접 보조 교사의 역할로 기성 세대들의 학습을 도와줌으로써 세대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소통의 장인 SNS 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세대간 소통의 활성화'

송경남(경영 4): 지금까지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먼저 SNS 의 여러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인터넷의 문제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멘토, 멘티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행해지기 전에 먼저 SNS 및 스마트폰 기기 활용에 대한 기성세대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것을 젊은 세대가 도와주는 역할을 행하면서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각각의 세대는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닌, 각각의 세대는 성장해온 환경이 다를 뿐 연속선상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연속선상에 놓인 각각의 세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부재되어 있어 세대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틀림이 아닌, 서로가 자신이 맞다고 우기고 틀렸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순간 우리가 꿈꾸는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⑨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앞쪽부터 오민석, 전용택, 유하정, 고성헌, 주연아 학우

주연아(경영 3): 오늘은 지난 5 월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월례토론회의 주제였던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를 바탕으로, 대학생인 우리의 관점에서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세대 간 소통' 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논의인 만큼, 우선 '세대'를 제대로 정의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 있어서는 세대를 '어르신 세대',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젊은이 세대' 로 나누어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치관 차이 때문에 두 세대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고성헌(자연환경공학 3) : 제 생각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어르신 세대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이젠 100 세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르신 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무기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겠지요.

그보다는 여전히 일에 대한 의욕이 있고, 젊은이들도 그분들과 이야기 하면서 뭔가 배울만한 부분이 있다면 인식을 가져야 할 것같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방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tv N 채널에서 진행한 적 있는 '꽃보다 할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할아버지들에 대한 인식이 '엄하고 무뚝뚝한' 이미지에서 '친근하고 자상한' 쪽으로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전용택(융합전자공학 3) : 덧붙이자면 어르신 세대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다른 세대들이 이해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아프리카 TV' 라는 사이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사이트인데요, 몇 년 전 어떤 할아버지가 방송을 진행하셔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분께 ‘어떤 계기로 방송까지 진행할 생각을 하셨나?’ 하고 여쭤보니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라고 대답하셨더라구요. 아마 인적이 드문 시골에 사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직접 여러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프리카 TV’를 활용할 생각까지 하게 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점을 보면 ‘어르신 세대는 고집이 세다, 재미없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건 오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민석(생명과학 4) : 방송 등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거시적인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같은 개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SNS 장’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페이스북 유머 페이지’를 하루에도 몇 번 자주 보시기 않나요?

유머 페이지에 재미있는 글들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만큼 페이지 관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빠르게 전파되고, 자연스레 페이스북 페이지가 요즘에는 큰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세대 간의 오해를 풀고 친근감은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테마로 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운영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불어 어르신 세대가 이런 글을 접하게 된다면 이러한 글을 작성한 젊은이에 대한 친근감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SNS에서의 소통을 통한 세대 간 이미지 개선

전용택(융합전자공학 3) :저도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년까지 요양원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했었는데, 주로 할머니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지켜다보다 보면 할머님들 사이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런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공간에 소개할 수 있다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유하정(생명과학 1): 저는 지금의 논의가 젊은이와 어르신 세대의 소통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단 어르신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방안도 이야기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한 방안은 뭐니뭐니해도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즉,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는 만큼 자신이 속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부모님과 자녀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 중에도 부모님과 친밀한 사이인 사람치고 다른 부모님 세대와 같은 나이대의 분들께 잘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 없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부모님, 또는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부터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주연아(경영 3): 가정에서부터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해요. 여기에 덧붙이자면 부모님 세대와 젊은이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도 서로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아랫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처럼 부모님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자녀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고자 노력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도 드리고, 또는 주말에는 함께 여가 활동을 하는 걸 제안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성헌(자연환경공학 3) : 중학교 때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특이한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날마다 학교에서 집에 가면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하는 과제를 내 줬던 거죠. 예를 들면, '사랑해요'라고 말해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지 등을 적어오는 게 과제였어요.

어린 학생이었던 당시에는 그 중요성에 대해 잘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과제를 꾸준히 하면서 부모님과 뭔가를 함께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인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연아(경영 3) : 네. 학교에서 숙제와 같은 개념으로 매일매일 실천한 과제가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가족 간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세대 간 소통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세대를 어르신 세대,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의 세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어르신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방송과 같은 매체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기존에 어르신 세대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무뚝뚝하고 엄한' 이미지가 아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다면 더욱 쉽게 어르신 세대에서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아가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어르신 세대 또는 부모님 세대의 일상 이야기를 테마로 한 페이스북 페이지와 같은 공간에서 이러한 에피소드의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서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는데 좋은 영향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렇듯이 기본이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논의가 마무리된 것 같네요. 가정 또는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나아가 다른 기성세대에 속한 분들은 만날 때도 어려움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는 논의로 오늘의 연구모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미지출처)
자료 2:
http://brazilianportuguese.info/wp-content/uploads/2010/10/different-greetings.jpg
자료 3:
http://www.visionmobile.com/wp-content/uploads/2009/09/visionmobile_112.jpg

⑩ 배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이기현, 김예진, 최다은, 이세현, 박하연

김예진(바이오·의생명 2) : 지금부터 배재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5 월 22 일 개최한 제 85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며 자유로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그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는 주체에 놓여있는 기성세대가 먼저 이기심을 버리고 책임감을 갖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공익을 위해 헌신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 등의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박하연(간호 2): 저 역시 김예진 학우처럼 기성세대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신세대보다 문제가 더 많다는 식의 의견이라기 보단, 신세대를 포용하고 이끄는 '선배'의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본보기가 되어 소통의 장을 구축하려 하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후배'인 신세대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모든 국민들의 슬픔이 되었던 세월호 참사가 기성세대의 노력이 요구되었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선장과 선주, 감독기관의 이기주의로 비롯된 이번 사건을 통해 기성세대는 신세대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개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성숙함을 길러 신세대들의 불신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다운(미디어 1) :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기성세대가 흔히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죠. 이것이 단순히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이라기보다는 신세대의 행동에서 비롯된 말은 아닐까요? 자유와 개성으로 대표되는 신세대적 사고방식은 그들에게 하여금 그들의 행동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지'를 만들어주고 대신 기존의 기성세대들을 보편적인 혹은 틀에 박힌 정형화된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신세대가 본인들에게만 관대한 모습을 보이며 기성세대를 비난하는 일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어울림'이 필요하다.

이기현(바이오·의생명 4): 앞서 두 학우께서 기성세대의 문제점, 신세대의 문제점을 짚어 주셨는데요. 저는 어느 한 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소통을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어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과 견해가 다른 두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위해서는 함께할 수 있는 '문화'의 발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 스포츠는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최적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시즌이면 어김없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이, 월드컵 시즌에 우리나라의 경기가 있었던 다음날이면 경기에 대한 각자의 분석이 대화의 주제가 되곤 합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분야이고,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문학, 음악과 같은 문화 활동 역시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대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는 이처럼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의 발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이세현(원예조경 2) : 이기현 학우가 들어준 예처럼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어떨까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즉 우리가 '세대차이'라고 부르는 것의 근원은 서로의 행동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세대 간의 차이 또한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 다른 세대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배려와 양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최신 기기를 함께 배우며 기성세대는 유행에 민감한 신세대를, 신세대는 기존에 익숙하지만 유행의 틀이 되어준 기성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김예진(바이오·의생명 2):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보다 자유로운 소통을 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선진사회를 일구어 나갈 대학생, 즉 신세대의 입장에 놓여 있지만 기성세대와 신세대 모두의 시각에서 세대 차이라는 문제에 대해 바라보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 간격을 줄여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적교류를 나누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⑪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구미연, 김유라, 최우석, 원준희, 황정규

김유라(심리학과 4) : 더운 날에도 이렇게 모여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윗사람에 대해 공경을 하는 '유교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고, 서로간의 다름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지난 5 월 22 일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은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세대 간 서로에 대한 오해의 폭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을 일깨우고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먼저 세대간의 소통이 어떻게 단절되었을까요?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연(정보통계학과 4) :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뛰어난 소통 기구지만, 많은 곳에서 부모와 자녀 즉, 세대간 소통의 축소와 단절을 가져오는 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저소득층에 보급한 정책은 저소득층 자녀가 컴퓨터 과다사용에 빠지도록 하여 세대 간 격차를 더 확대시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정서적 충돌을 넘어서 경제적 충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핵심 자산인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2030 세대는 떨어지길 원합니다. 또 정년 연장을 두고서 일을 더하길 원하는 중년 세대와 단지 일자리를 빼앗기로 여기는 젊은 세대간의 인식 차가 큽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준희(의생명소재공학과 5) : 담배 판매를 거부한 74 세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 불구속 입건, 본인의 애완견을 때렸다며 이웃 노인을 숨지게 한 30 대 여성과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한 이유로 80 대 노인을 폭행한 40 대 구속.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다른 세대와 직접 부딪혀 가면서 소통의 노하우를 터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세대의 소통하는 법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안에 뜻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것을 캐치해야 소통이 됩니다. 어르신과 소통을 하는 것은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서로간의 다른 세대가 필요에 의해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교감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대들을 일정부분 친구처럼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를 배려하는 반응이 아니라 본인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황정규(경제학과 4) : 어느 날 밤, 어두운 길을 지나가는 할머니를 누가 자꾸 불렀습니다.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그 할머니는 '나도 뒷모습은 아직 처녀인가 보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보청기를 끼고 걸어가던 할머니는 드디어 알았습니다.

"갈치가 천 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데에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잠깐만 딴 생각을 해서 못 알아 들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가치관, 성별 그리고 연령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오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한상진교수가 독일, 칠레, 페루 그리고 남아공과 같은 정치권의 소통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한국이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윗세대와 아랫세대, 좌익과 우익 다 없이 심각한 소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유라(심리학과 4) : 세대 간의 소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감정 격차도도 심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의 격차라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는데요.

저는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무엇을 일깨우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부모로부터 인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우석(경영학과 4) : 사회 갈등 중에 하나로 뽑을 수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2013 년 국제 연구인 나라별 교사 존경도 조사결과 한국이 최하위인 21 위였습니다. 우리가 '교권이 무너졌다' 라든지 '학생들이 학교 교사를 믿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에 사교육 열풍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BS '따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박현성이라는 권투선수가 나옵니다. 이 선수의 별명은 불사조 피닉스입니다. 권투 중에 부상을 당해 조폭을 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권투선수로 키웠다고 합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하자가 그 분의 취지였습니다.

이분의 지도하는 방법은 바로 공감,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학생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학생이 공감을 하고 내가 믿고 있다고 깨우쳐주는 것이었습니다. 방송 도중에 그 문제아가 약속을 어기고 늦게 와서 핑계를 댔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각한 학생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생각하고 믿음을 준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와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서 공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느끼고 믿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연(정보통계학과 4) : 베르나르 베르베르 원작인 '나무'에 나오는 사람들은 노인을 '자기 몫의 회전이 끝났음에도 회전목마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이와 노인 모두를 동등한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고 받는 세대로의 구분이 아닌 개개인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유토피아에 가장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입니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곳은 이 복지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세대 간의 많은 시간을 거쳤습니다. 우리도 이것처럼 하려면 한국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령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정규(경제학과 4) : 노르웨이는 소득의 50%의 세율을 냅니다. 우리나라는 최고 38%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가계부채 1000 조이며 국가부채 1000 조입니다. 이런 복지들은 당연히 공짜가 아닙니다. '노인을 돌보면 지원금을 준다, 대신 소득의 50%를 내어라' 라고 할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오히려 현재 세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복지를 늘리려다 국가 부도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지를 실현할 수 없는 이유는 정말 마땅히 복지혜택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오를 것이고, 국민연금도 아마 2060 년도에는 고갈될 것입니다.

구미연(정보통계학과 4) :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다른 선진국이 실현하고 있는 것을 한국이 그대로 실현하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국형복지에 맞춰 조금씩 바꾸자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원준희(생물의소재공학과 5) : 세대 간의 소통을 시도를 할 때 잘하기 위한 덕목을 말하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일 읽고 또 서로간의 존중과 배려가 있다면은 이것은 성공적인 소통입니다.

세대 간에 있어서우리가 다를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우기기일 뿐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세대 간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를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들은 소통에 있어서 정말 반대되는 생각들입니다. 오히려 소통은 나의 특정한 부분을 개방하고 그것을 비움으로써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 준다면 비로소 진정한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간의 갈등을 다룬 SBS스페셜, '단사협통'

황정규(경제학과 4) : 저는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만사형통 3 부 인데요. 이것은 어버이 연합회와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갈등을 다룬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어버이 연합회의 수석부장이고, 희망버스를 지지하는 층은 진보이며 김남훈 프로레슬러입니다. 이 둘의 만남을 그린 것입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지식인 100 명을 막는 가장 큰 것은 48%의 반대 의견에 대한 관용부족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나오는데, 마지막엔 서로에 대한 인정을 하며 갈등을 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엔 갈등이 아주 심했지만, 잦은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슬러가 실제로 어버이 연합회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어버이연합회가 참여연대를 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서서 직접 모습을 보니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얼굴을 마주하는 것,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무게중심을 잡아보는 것 등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른 목소리, 적이라고 생각했던 상대편과 친구가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원준희(생물의소재공학과 5) : 세대 간의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아랫세대들이 윗세대들과 소통을 단절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할게요”라는 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 뒤에는 윗세대들이 정보가 소거된 채로 젊은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윗세대들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윗세대들의 사고방식이 주체에서 빠지게 되는 젊은세대들의 행동방식은 소통의 단절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또 ‘윗세대’를 모셔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와 다 똑 같은 사람으로서 욕망이 있는 사람으로 받아 들일 때,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석(경영학과 4) : 텍사스 연구진이 연인 80 쌍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커플이 훨씬 더 교제기관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사회 갈등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이 의사소통을 얻어내는 9 가지 방법을 설명하였는데요. 듣기, 상대입장 존중, 내 대화법을 바꾸고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기, 입장 바꾸기와 대화의 양 조절, 부정적보다 긍정적인 것에 초점 두기, 상황과 맥락에 맞도록 말하기, 혼자 떠들지 말기 등을 말하였습니다.



김유라(심리학과 4) : 세대 간의 단절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현재는 출처를 알기 힘듭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방관하는 자세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제도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과 같이 기성세대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당연히 아랫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처벌을 하는것보다 사랑과 배려를 일깨워주어서 다른사람에게도 베풀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윗세대를 대할 때, 수동적인 자세로만 여겨질 수 있는 단어를 지양하고, 좀 더 넓은 생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대인관계에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uy96L5GleQY

⑫ 군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전라북도 연합 대학생 연구모임 진행 모습 (이경은, 김예은, 라윤정 외 7명)

김현경(군산대 해양 4) : 지금부터 군산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사전에 초청장으로 안내해드린 것과 같이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 5 월 22 일 개최한 제 85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례회를 통해서 소통과 권위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언급하신 권위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세대 간에 권위가 필요한 것이지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통해 일궈낸 경제발전 속에서 도약을 위해 필요했던 지도자의 통솔이 권위로 잘못 인식되어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앞서나가는 현 시대에서 소통을 위한 권위의 올바른 잣대를 대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형성하고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소통과 관련하여 권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세대 간의 소통의 선진화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은(전주대 사회복지 1) : 저도 이번에 전달해주신 초청장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권위'에 대한 의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 전면에 걸쳐 인식된 권위는 강하고, 억압적인 이미지가 강하며 이러한 인식을 가진 기성세대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변화되었지만,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상을 구현하는 가정의 모습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선은혜(서해대 음악 1) :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라게 된다고 하여서 기성세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직적인 상하관계의 가부장적인 집안에서의 소통은 일반적으로 수신과 발신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일방적인 소통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양방

간의 서로 교통하는 소통이 주된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주된 의미가 진정한 소통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윤정(군산대 회계 3) :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현재 정권은 소통을 핵심 포인트로 내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기성세대가 말하는 소통과 현세대가 말하는 소통의 의미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하여서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소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소통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이 생각하는 소통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소통을 빙자한 불통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김현경(군산대 해양 4) : 세 학우 분들은 소통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새로이 구축하여 두 집단 간에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일방적인 소통의 예로 가부장적인 가정을 통해 일상에서 접할 수 있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통의 참된 의미를 구축하고 두 집단의 이해를 돕는 것 이외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또 무엇이 있는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은(군산대 미디어문화 3) : 저는 이와 같은 경우도 미디어 매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연구모임에서는 단순히 미디어를 통한 무의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소통이 바로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각계각층을 불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경 학우의 토론전문 첫 번째 내용에서도 언급되었던 종편채널의 JTBC 의 '유자식 상팔자'와 같이 세대의 이해관계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희(예원예대 귀금속보석디자인 2) : 소통이라는 것은 같은 상황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시대상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디어 매체가 다수의 집단 중 표본이 되는 출연자들을 통해서 기성세대와 현세대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경 학우와 이경은 학우가 말한 '유자식 상팔자'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여주었듯이 정치인과 국민, 교사와 학생 등 일반적으로 생각할 시에 일방적이라고만 생각했던 관계들의 소통의 장이 미디어로 보여진다면 훨씬 더 쉽고, 받아들여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혜빈(동의대 항공서비스 2) :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통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딱딱하게 다가온다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면 서로 마주하지 못해 벌어진 이해하지 못한 관계에서도 표본의 대중적인 생각을 듣고,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집단 간의 충돌이 훨씬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경(군산대 해양 4) :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장을 구체적인 프로그램 방안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들어주면서 실제적으로 의견을 내주신 학우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미디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김주영(군산대 음악 2) : 저는 정책적으로도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교육정책을 통한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세대는 다음세대가 성장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성세대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냥 기성세대와 현세대라는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사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세대가 바뀌게 되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수경(한경대 동물생명환경과학 2) : 가장 가까이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기성세대가 된 부모님은 20 년 전만 하더라도 현세대였음을 감안한다면, 당시 본인들이 받으셨던 교육에 있어서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한 것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세대로 이어가는 소통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빚어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을 교육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는 발언권에 대한 권리와 이를 수용하는 입장에 있어서 기성세대들의 태도를 정부와 학교 및 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영환(군산대 수산생명 1) : 정부와 학교 및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은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소통교육이야 말로 기초적인 교육의 토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제 아무리 열심히 받고, 수용할 능력을 키웠다고 해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생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경(군산대 해양 4) : 네,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되는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요. 의견을 제시해 주신대로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해도 이를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미디어를 통한 전 국민적 참여와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활동으로는 교육을 통한 실천방안이 제시되었는데요.

많은 대학생들과 국민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우 분들이 직접 제시한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참여활동과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자발적인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관망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였던 소통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내릴 수는 없지만, 많은 학우가 이야기하셨듯이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 제시된 여러 실천방안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선진국으로 앞장서서 나가는데 중요한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⑬ 공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심현보, 김현기, 박수경, 양연보, 구예슬

심성보(공주대 화공 2): 제 4 차 공주대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메일로 초청장을 보내드렸듯이 지난 5 월 22 일 재단 법인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 열린 5 월 월례토론회에서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세상을 살면서 남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함을 잘 아실 것이며, 대학생 입장에서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조원 간의 소통을 통해 팀워크가 잘 이뤄질 때 분위기도 좋고 과제도 잘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소통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런 소통의 문제를 기성세대의 권위 상실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기성세대의 권위가 상실된 사례를 말씀해주실 분 있나요?

구예슬(공주대 화공 4): 저는 대중교통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는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신의 앞에 노약자가 서 있어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잠자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예의지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기성세대의 권위가 많이 상실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현기(공주대 화공 4): 저는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공인이 일으킨 범죄, 국회의원들의 비리 등이 기성세대의 권위를 상실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는 중요한 자리인데 어느 안건을 처리하다가 대화가 아닌 폭력을 씁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국회의원들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황당함과 동시에 실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박수경(공주대 화공 4): 저는 초, 중, 고등학교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기성세대가 가정에서의 부모님과 학교에서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스에도 많이 부각되었지만 교권의 상실로 인해 선생님이 학생을 통제하기 힘들게 되었고 무시 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양인모(공주대 화공 3): 저는 요즘 자주 발생하는 가정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폭력이라고 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녀가 부모를 확대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성보(공주대 화공 2): 이렇게 기성세대의 권위가 상실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칼럼을 통해서 교통 법규 준수를 예로 들면서 기성세대가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기성세대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수경(공주대 화공 4): 저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기사가 사건, 사고, 범죄 등의 부정적인 사례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부정적인 사례를 부각하기 보다는 아름다운 사례의 보도를 증가시켜서 기성세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인모(공주대 화공 3): 기성세대의 권위 회복을 위해 가정에서 '효'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자녀를 '공주님', '왕자님'처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의 경우 성격이 자기위주로 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못 배우기 힘듭니다.



김현기(공주대 화공 4): 저는 공모전과 포스터를 통해서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시키고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예슬(공주대 화공 4): 저는 심성보 학우가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견에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 이외에도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기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에티켓 등의 사항들 또한 지켜나가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성보(공주대 화공 2):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기성세대의 권위가 깎인 사례로써 대중교통에서 노약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행위 그리고 교사의 권위 상실에 따른 문제점과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언론의 역할로써는 기성세대의 안 좋은 면을 부각하는 사례보다는 존경이 될 만한 사례의 보도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공익 광로를 통한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공모전과 포스터를 통한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효'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것과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출처-

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54902

⑭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덕주 최혜민 유민효

장윤석 (원광대 신방 4) : 지금부터 전북연합 4 차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차 연구모임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84 차 월례토론회에서 나온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요즘 사회를 들여다보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박효종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최근 세월호 사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성세대가 자기반성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김현란 성음 유치원 원장님은 어릴 때부터 배움의 교육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유치원 교육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재은 서울 미동초등학교 교사는 기성세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책임의식을 갖고 고정관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김석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학관님은 현재 놀이문화의 개선을 짚어주며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유치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교육이 성장기에 성격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교사의 자질, 미디어를 통한교육, 아이들과의 대화를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패널분들은 유치원 교육을 통해 어떻게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호원대 자동차과 4) : 유치원 교육을 통한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치원교육의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국가에서는 90%이상이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아기때 정체성을 살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더욱 많은 유아들이 정체성을 살릴 수 있고, 이는 소통의 원활화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통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혜민 (원광대 경영 2) : 저는 유아 복지제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어머니로 살기 좋은 나라로 “뭇레”라는 이름의 대자연을 배우는 유아 서클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1 년에 여러 차례 행해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하여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뭇레를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데 필요한 예절과 적응력을 유아기 때부터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퇴원할 때, 9 개월 동안 무료로 자동차에 부착되는 ‘베이비시트’를 빌려 주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아복지가 우선되어야 성격과 사교성 발달이 진행되는 유아기에 보다 질적인 체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윤석 (원광대 신방 4) : 김덕주 학우는 선진국 사례를 빗대어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선진국에서는 90% 이상이 무상교육을 통해 정체성을 살리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주며 우리나라에 무상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주었습니다.

최혜민 학우의 경우에는 스웨덴을 빗대어 유아 복지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복지가 우선적으로 제대로 시행되어야 성격과 사교성 발달이 진행되는 유아기에 보다 질적인 체계를 잡을 것이라고 언급해주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의견 있으신 패널분 있으신가요?

유민호 (원광대 신방 3) : 저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유치원 교육을 위해서는 미디어의 시청을 줄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TV 프로그램 시청 하기를 좋아합니다. TV 시청을 하다 보면 대화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원활한 유치원 교육을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한 교육보다는 대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석 (원광대 신방 4) : 유민호 학우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유치원교육에서 미디어를 통한 교육보다는 대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제시해주었습니다.

올바른 유치원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소통 선진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진화 과제 23:

시민의식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제 73 차 월례토론회)

1.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김민희(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당신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 생각하시나요? 과연 경제 GDP 나 수출입 수준 등의 가시적 지표만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현재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이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GOAL 은 바로 시민의식의 선진화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입성하기 위해 꼭 이루어야 할 목표이자 우리들의 이상향입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 급속한 경제성장을 했고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일명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동시에 점차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예전보다도 저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만 추구하다 보니 질적인 성숙은 놓치고만 것이죠.

시민의식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흡연자 비율, 교통사고의 비율, 문맹자 비율, 낙태의 비율 등이 그 지표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지표들 중 다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2 위를 다투는 아주 창피한 기록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인 지표들로만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과 달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부딪쳐도 서로 눈을 흘기며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놀라는 것들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의식과 그의식에서 비롯되는 이기적인 행동에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길에서 사람과 부딪치거나 아니면 비켜달라고 말을 할 때에 무조건 "Sorry" 나 "Excuse me" 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나오더군요. 또 건물에서 나오거나 들어갈 때에 뒤따라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준다든지 열어주는 행위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국 시민의식의 수준이 이렇게나 낮았던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 누구 하나 뒤따라 오는 사람을위해 문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심지어 제가 문을 잡아주어도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몇 사람들은 그사이로 휙 지나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부딪쳐도 사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심지어 눈을 흘기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짧은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저도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놀랐을 정도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러한 일들을 겪었다면, 아마 그들이 받았을 문화충격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급격한 경제 고도 성장으로 인해 질적인 면에서는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 또한 발전에 따라 사회 전반의 위험과 사고는 급격히 늘어가지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와 장기적인 전망은 부족하다는 점 등이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두 가지 입니다. 먼저 '공동체 의식의 함양' 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장을 중시하던 역사를 갖고 있어 남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는 '성공'이라는 가치보다는 '공동체'나 '배려', '인간존엄성'에 관련한 가치를 중요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개개인의 꾸준한 노력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한 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일 것입니다.

또한 개개인의 노력과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바탕에는 그에 맞는 사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명 '솜방망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법 적용이 강력하게 변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법 적용이 매우 강력하여 질서의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가 남의 집 앞 잔디에 배변을 봤지만 모른 척 하고 간다면 집 주인에게 소송을 당할 정도로 파렴치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강력한 법 덕분에 시민의식이 자연스레 높아진 경우이죠.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작은 경우부터 성범죄와 같은 큰 사건에서 마저도 아주 약한 법적 처벌이 가해집니다. 그 때문에 사회악과 각종 비윤리적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탄탄한 법치국가의 확립이 곧 그 나라의 시민의식의 선진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민의식의 선진화는 경제 성장과 같은 가시적인 요소들보다 좀 더 장기적이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적 같은 경제성장 뒤에 놓쳤던질적인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바꿔놓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성공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여유롭게 SLOW DOWN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질 것이고 이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선진국에서 역행하는 길을 걸을 것입니다.

② 김상훈(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한국인은 공부 잘하는 민족이다. 한국 학생들이 국제 올림피아드대회만 나가면 온갖 상을 휩쓸기 일쑤고, 3 년마다 세계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를 순위로 평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평가(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Assessment)에서도 2006 년 과학부문을 제외하고는 12 년 연속 상위권을 기록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높은 교육열을 직접 거론할 정도로 부러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인이 똑똑하냐고 묻는다면 글쎄,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 물론 '한국인이 바보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를 G20 의 반열에 올린 놀라운 기적만 봐도 한국인이 우수하면 우수했지 결코 바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높은 교육열, 우수한 학업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학술분야의 노벨상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으며,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타기업 베끼기에 급급해 카피캣(Copycat: 잘 나가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제품을 비하하는 용어)이라는 악명을 얻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역설을 타파하기 위해 '창의력과 창조성'을 지원하는 미래 창조과학부를 신설했지만 집에 책장을 놓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듯이 부처를 하나 더 만든다고 사회에 창의력과 창조성이 함양되는 건 아니다. 도대체 공부 잘하는 한국인이 똑똑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나는 그 이유를 의외의 곳에서 찾고 싶다. 바로 '시민의식의 결여'이다. 더 나아가 문화의 부족, 교양의 결핍이다. 최근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바로 자기계발서의 부상과 흉악한 범죄의 증가인데 이 둘은 한 가지 공통점이있다. 바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보다는 남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처세가 우선한다는 거다.

대학 간판과 학벌이 '신분 상승의 정도(定道)'이고 돈과 지위가 '자존의 척도'라는 사회에 만연한 이런 기형적인 인식은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계로 만들었고 오직 남보다 위에 올라서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인문서(人文書)를 읽기보다는 남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도록 가면으로 가리기 위한 처세술을 배운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1 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재산의 자유, 선택의 자유만 강조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은 도외시하니 자신의 지위와 부를 발판 삼아 성상납과 뇌물을 거침없이 받고, 이러니 덕수궁 앞에서 자신을 사회적 약자로 포장하며 불법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니 창조에 투입되어야 할 열정이 고삐 풀린 망아지인 양 흉악한 범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진리'가 상정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법이 권위를 가질 수 있고 창조성이 함양될 수 있단 말인가. 남의 것을 베끼는 게 얼마나 우스웠으면 인류의 지식에 한층 더 기여해야 할 논문이 '창조적 짜집기'가 되버렸단 말인가.

창조 한국이 되기 위해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시장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책상 앞에서 하는 '주입식 진리 교육'이되어서는 안 된다. 다루기 쉬운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프로이센에서 시작된 이런 획일화된 교육은 학생들에게 기형적인 시민의식만을 계속 심어줄 뿐이다.

나는 선진의식을 제고하고 창조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 번째는 도서관의 확충 및 독서 프로그램 확대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존 스튜어트 밀, 아이슈타인, 에디슨은 물론 미켈란젤로, 고흐, 로댕, 피카소, 베토벤, 바흐 같은 예술가와 음악가, 더 나아가 워렌 버핏, 손정의,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현대의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소위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독서광이었다. 그것도 각자의 분야에 쏠리는 편식 독서가 아닌, 인문 고전에 기초한 건강한 독서였다.

창조성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사상과 생각이 서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다양한 사상과 생각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책이다. 따라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각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설상가상으로 한국인의 독서량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다가 위에서도 거론했듯이 대부분 분야가 자기계발서에 쏠려있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복지보다는 도서관과 독서 프로그램 확대가 더 시급하다. 복지로 얻는 혜택은 개인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도서관과 독서 프로그램에서 얻는 혜택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는 그 순간의 효용을 극대화하지만 도서관과 독서 프로그램은 평생 내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다. 개인에게 풍부한 교양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창조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책을 쉽게 접할 수있는 환경이 필수다.

두 번째는 사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다. 나는 이러한 모델로 경희대학교의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꼽고 싶다. 경희대는 2011 년부터 '문명을 성찰하는 교양인' 양성을 목표로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출범시켰다.

경희대 학생들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커리큘럼에 따라 35~56 학점에 달하는 교양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 중 '시민교육'이라는 수업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세를 배우고 그 과제로 학생들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한다.

그 결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시되어 있던 '사랑'의 사전적 정의가 성적 소수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시중에서 파는 생맥주 양을 속일 수 없도록 서울시가 직접 행정지도를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학생의 조그마한 참여가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다.

경희대학교의 후마니타스 칼리지, 특히 시민교육을 초·중·고로 확대해야 한다. 시민으로서의 의식, 시민으로서의 태도, 시민으로서의 행동을 배우고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여 직접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회를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고민은 벤처 창업자와 일맥상통한다. 시민교육이 결국엔 창조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취업이 힘든 이유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꼽았고 이러한 열악함을 대기업의 탐욕과 악행 탓으로만 돌렸다. 잠시 대기업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나 자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자.

그저 부와 지위를 '소중히'하는 마음에 중소기업과 창업을 기피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정공법에만 집중하지는 않았는지. 인간으로서의 인간, 사회에서의 민주시민이 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한 건 아닌지.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려는 적극성이 곧 개인의 경쟁력이고 시민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곧 개인의 창조성이다. 그저 책상 앞에 앉아 공허한 진리만을 달달 외우기보다는 진정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민의식 함양이 곧 창업 국가가 되기 위한 발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③ 김소은(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의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하는 입장으로 바뀔 만큼 큰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의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성장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정직• 배려• 준법정신과 같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시민의식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경제성장 만큼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경제적인 성장에 비해 떨어지는 시민의식 부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한 가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 저명인사나, 지도층의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대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문제는 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매번 터져나옵니다. 또 기업인들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 상속문제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시민들의 의식에 악영향을 미쳐, 시민의식의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오히려 시민의식의 정착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는 지도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배려와 사랑, 정직과 같은 덕목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역할을 할 만큼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스님이라 불리는 법정스님도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에 대한 윤리규범과 실천덕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역사속에 있는 훌륭한 위인들을 롤모델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선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창호선생을 롤모델로 삼음으로써, 사람들은 정직이라는 가치에 대한 신념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들을 롤모델로 삼아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의식의 성장을 이루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롤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롤모델을 통한 시민의식 선진화의 파급력은 매우 큰 편입니다. 일례로,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면서 안구기증을 하셨고, 이로 인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되찾았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 장기 기증 신청자가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법정스님의 경우에도, 그의 삶에 대한 윤리규범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법정스님이 입적한 이후에도 여전히 큰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몇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해 롤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롤모델이 없다는 핑계로 개인들의 노력이 부재하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만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개인이 먼저 선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 덕목들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롤모델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롤모델이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내공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롤모델의 솔선수범과, 내가 먼저 실천하겠다는 개인의 노력이 모인다면 우리 사회에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말은 옛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정의롭고 시민의식이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④ 김유나(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우리나라는 몇 백 년에 걸쳐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낸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몇 십 년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산업과 경제면에서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적 평가는 물론 국외적으로도 선진화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강대국이라는 평가는 그다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면에서는 2011 년 기준 GDP 세계 15 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문화환경 지수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율, 지역사회참여율, 준법질서의식, 교통질서준수, 자원봉사참여율과 같은 사회지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식 기술적 측면 외에도 인성, 정서, 도덕성 측면에서 충분히 교육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너무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면서 단편적이 기계적인 사고가 되다보니 자기 중심적인 행동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길러지는 데에 교육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평가도 몇몇 있는 정도입니다. 교육의 본래의 목적과 참의미를 되살려 인성과 정서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성인의 독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 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2011 년 1 년 간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은 독서율은 66.8%에 그쳐 성인 10 명 중 7 명도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선 의식의 성숙함이 밑바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자료는 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변화 속에서 더욱 더 즉각적이고 빠른 것들만 찾아왔습니다. 좀 더 주위를 둘러보면서 성숙된 의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지만 좀 더 선진화된 한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참여율도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함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중,고를 다니면서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일정시간 채우게끔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정말로 자원봉사의 본래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일까요? 학생들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시간만을 채우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러 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자원봉사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어 자원봉사를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선진시민의식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앞서 말한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의식을 제대로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세 가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바른 교육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쟁 속의 성적내기의 교육이 아닌 인성과 사회성, 도덕성, 윤리의식과 같은 교육에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농어촌인성학교〉지정, 창의적 특색활동을 하는 학교에게 〈인성교육 실천우수학교〉지정 등과 같은

방면으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하에 수업 내에서 구체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의 예시 외에도 우리가 당장 지하철만 타더라도 우리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면서 이기적으로 변하게끔 만든 사회의 탓도 있겠지만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앞만 향해 달리는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빠르게 앞만보고 달려왔습니다. 50 년대 최빈국에서 어느덧 G20 회의 개최국까지 오느라 옆과 뒤를 살펴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더 이상 앞만을 내다보는 것이 아닌 뒤를 돌아볼 여유와 주변을 챙기는 배려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정책적으로도 교육측면, 문화측면에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순환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만을 강요하는 입시전쟁이 아닌 배려하고 협력하는 인성을 가르치는 교육과 물질만능주의가 아닌 책이 풍부하고 문화적 요소가 풍요로워지는 여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국가가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⑤ 김한얼(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산업화->민주화->?

'대한민국 호'가 닻을 올린 1948 년 이래, 지난 60 여년 간의 역사는 가히 한 편의 성장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온갖 역경과 불운을 이겨내고 결국 성공을 이루어내는 성장드라마처럼 대한민국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다면 한다'는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일구어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산업 역군들의 위국헌신과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강국이자 정보 기술(IT) 강국으로 당당히 G20 의 반열에도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조롱과 멸시를 받곤 했던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민주화를 훌륭히 이뤄낸 본보기로 민주주의 발전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명실공히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나라로 우뚝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의 발전은 눈부신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무색하게 하는 심각한 병리적 양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단시간 내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빨리빨리' 문화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와 같은 수단/성과 만능주의를 낳았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건 등과 같은 대형 사고들은 안전을 무시한 빨리빨리 문화가 낳은 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심조심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교통질서에도 과거 빨리빨리 문화의 DNA 가 그대로 유전되어 교통사고발생률 1 위라는 오명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면서 얻은 고속성장의 이면 때문에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가 성장통을 딛고 세계라는 바다에서 오랫동안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에 조타수 역할을 하는 시민들이 자성의 마음으로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즉, 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개인의 양심 회복과 인격적 성숙이 완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가치들이 서로 공유되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민의식 선진화를 이끄는 신(新)사회운동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선진화'라는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의 주체인 시민들 사이에서 선진화를 위한 '합의된 모종의 가치'가 공유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공유된 가치를 전범(典範)으로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新)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전국 교통사고율 최고의 도시였던 광주광역시에서 사고율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라는 가치를 공유하고자 시작하였던 '착한 운전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교통사고 1 위라는 오명을 얻게 된 계기는 낙후된 교통 인프라와 단속의지 부재 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교통질서를 경시하는 시민들의 의식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 근본부터 해결하려는 것이 이 운동의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운동의 범시민적 확산을 위해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2009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5 대 강령(낮 시간 전조등 켜기, 난폭운전 줄이기, 주간 전조등 켜기, 교차로 신호체계 준수/무단 횡단 금지, 서로 양보하고 먼저 인사하기 등)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민·관·경이 십시일반한 이 시민운동의 의의는 '교통안전 준수'라는 다소 진부하고 당연시되는 명제를 재조명함으로써, 시민들 사이에 공유된 가치의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이러한 의식이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식의 주체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옮김으로서 결국 자신들의 안전문제와 더불어 시민의식까지 한층 진일보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운동의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공감, 공감을 통한 실천, 실천을 통한 선진화

얼마 전, 국제기구(IRTAD)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발표해 온 통계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자동차증가율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매년 소폭 감소추세에 있는 OECD 가입회원국 평균사고율의 11 배가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전 불감증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실례이며 동시에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일 것입니다.

또한 비단 교통사교율뿐만 아니라 여타 많은 부분에서도 한국 사회가 아직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수단 만능주의에 기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선진화된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저는 선진의식을 위한 Process 를 3 단계에 걸쳐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의식의 공감입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행태나 생각들이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공감을 통한 실천 과정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정하고 그러한 강령을 지키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련의 순차적 과정을 거치는 시민들이 늘게 되면 어느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각 개인이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동체로서 모든 국민의 행복을 실현시켜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도약을 꿈꿔봅니다.

⑥ 백유민(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집 밖을 나서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 장소를 항상 마주칩니다.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공공질서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통학을 하거나 출퇴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지하철은 특히나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을 세우는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면서 매번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 지하철 문이 4~5 번까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열차가 지연되면 오히려 승강장 내에 사람들이 더 많아져 혼잡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하철이 늦게 도착하여 뒤 따라 오고 있는 열차가 잠시 정차하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서울 지하철 상황을 사례로 들자면 2 호선 내선 순환열차가 한 바퀴를 도는데 1 시간 30 분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로 몸부터 들이밀어 지하철을 세운 까닭에 열차가 보통 20 분 정도 지연되어 대부분 열차가 도달하는데 1 시간 50 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승차다이빙'은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승객 본인에게도 큰 위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도리나 가방 같은 물건이 끼이면서 지하철에 끌려가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특히 위의 사진은 지난 2005 년에 있었던 일로, 전동차의 자동문이 유모차가 낀 것을 감지하지 못해 20m 정도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아이의 엄마가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무리하게 승차다이빙을 시도한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공공질서 준수는 타인의 편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철 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는 합니다. 지하철 내 전화통화나 대화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안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이 앉지 못하게 옆에 짐을 올려놓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이렇듯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 질서 지키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는 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러 교통수단이 발달한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교통 수단은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지하철에 탑승하면 휴대전화 예절부터, 가방을 무릎에 놓아야 한다는 것까지 자세히 설명된 안내문이 전동차 내에 붙어 있고 사람들은 이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일본의 지하철 내에서는 DMB 시청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를 통해 지하철 내에서 소음을 줄여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도 지하철 내에 탑승하면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꾸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한국의 모습을 살펴볼 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에티켓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과연 한 순간에 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즉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시행할 수 있는 에티켓을 지키기 위하여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통 예절이나 기본 공공질서에 관한 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따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질서에 대한 존중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길인 것을 아이들은 알고 실천하는 데요.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에서 손을 들고 건너는 것처럼 질서를 잘 지키고 배워나가는데 비해 오히려 어른들이 본보기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기본 질서조차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교육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교육을 통해 배려의 습관화를 이루는 것이 지속적으로 질서를 지켜나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민의식의 수준이 낮은 단계이지만 기본 에티켓을 지켜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⑦ 송경림(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당신은 무단횡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를 대며 횡단보도가 아닌 길로 가본 적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다.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서 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것이다. 만약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지각을 했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법을 지켜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소한 법은 법이라는 생각이 없는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있다.

선진국과 법은 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관계가 있다. 법은 일상생활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을 통해 법을 확립해 놓았다.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국가인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글로 써있는 실정법을 토대로 통치의 정당성을 가지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했다. 그리고 과거 판례들이 축적되면서 생성된 법을 통해서 법을 집행하는 영미법계국가인 미국과 영국은 이전의 사례들을 통해 자의적인 권력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이 절대적 우위를 가지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립했다. 위에서 언급한 선진국들의 경우, 법을 통한 국제적 신뢰와 국민의 신뢰를 가능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계국가로 글로 써있는 법 즉 형식적인 법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고 법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가 1% 부족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선진국들과 달리 준법의식의 부족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GDP 는 2012 년 1 조 1635 억 원으로 세계 15 위로 경제적인 선진국 달성했을지는 몰라도 시민의식에 있어서의 선진화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1% 부족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낮은 준법의식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2010 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시민 법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나 자신이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7.2%인 반면 다른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킨다라는 질문에는 28%로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내가 법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 명 중에 1 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절반 가까이 법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또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4 명 중 1 명에 그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법을 어렵게 생각하고 법이 우리를 위해 제정되었고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법을 왜 준수해야 하는 것일까? 오스트리아 법학자 H.Kelsen 는 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이유를 법의 효력의 근거에서 찾았다. 우리는 글로 써 있는 실제적인 실정법을 기초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실정법은 4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 최고의 법은 헌법이다. 헌법이 최고의 법인 이유는 모든 국민들의 동의하에 만들어진 헌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최고의 법인 헌법을 근거로 입법부에서는 작은 법률들을 제정하고 그러한 법률들을 기초로 법관가 행정관료들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최고의 법을 기초로 모든 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H.kelsen 은 말한다. 필자 또한 헌법은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여 만든 법으로써 우리나라가 예측 가능하게 질서를 유지하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즉, 헌법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일인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이에 따른 처벌 또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잘못해서 걸린 것이라는 생각보다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모습, 법을 지키면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필자는 교육과 리더의 모범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초, 중, 고 시절을 통틀어서 정식적으로 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법 과목은 배우기 어렵고 외울 것이 많은 전문 과목이라는 생각에 수강하기에 꺼려지는 과목이다. 필자가 원하는 법 교육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 시민의식을 위한 법 교육이다. 실제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법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식을 위한 법 교육이란 구체적인 법률 조항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선진국가와의 준법의식 수준의 차이, 법의 중요성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법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법의식 고취가 필수적인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현재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법 교육 활성화의 일원으로 '법교육진흥센터'를 곳곳에 설치하는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법 의식 고취를 위해 준법의식과 관련된 과목을 정규과목에 포함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정기적인 준법의식에 대한 특강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이 고취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대학생들 스스로 시민의식과 관련된 법 과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대학 측에서도 법에 대한 전공지식을 위한 과목이 아닌 시민의식 교육 수준의 법에 대한 많은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준수. 이러한 법 교육의 대상을 학생들로 좁게 보지 않고 시민들에게도 법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법이 남을 위한 법이 아닌 나를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예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준법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여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을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회 리더들의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면 이러한 교육은 보기 좋은 허울에 불과할 것이다. 각계 각층의 사회 리더들의 뇌물행위, 비리, 탈세, 등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이 뉴스에서 많이 보여진다. 법을 지키지 않고 사회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모습을 계속 본 청소년들과 시민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도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계 각층 사회 리더들이 먼저 법에 대하 관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는 모범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지키지 않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준법의식을 지키자고 교육하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과 리더들의 모범을 보며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되고 그들이 더 나아가 각계 각층의 준법의식 강한 리더들로 성장하여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유나(정외 12): 안녕하세요. 오늘 명지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 두 번째 연구모임 시간의 주제는 '시민의식의 선진화' 입니다. 범위가 포괄적이라 제가 쓴 칼럼을 바탕으로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선 사회문화한경지수 그리고 교육분야에서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약문을 바탕으로 시민의식의 선진화 중 사회문화환경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해보고 다음 교육적 측면으로 넘어가서 공교육에서 인성교육, 준법정신과 같은 도덕적차원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지예(정외 12): 군포시청의 경우 시청사 안에 '밥상머리 북카페'를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시청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접할 수 있도록. 이처럼 군포시청처럼 사회문화환경지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행정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양업(정외 12): 일단 저는 정부정책보다는 비정부단체랑 시민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봤어요. 사회문화환경지수가 준법지수도 포함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승시키려면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시민사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덴마크에 시민대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크루트빈이라는 사람이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통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평생교육시스템으로 공익과 사회참여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깨닫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사회문화환경을 개선하도록 참여 유도합니다. 행동의 동기가 필요하듯이 우리나라에서 사회문화환경지수가 높아지려면 자발적인 시민단체와 비정부단체가 활동에 나서주고 국가는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연(정외 06):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요?

최양업(정외 12): 시민단체도 좋고 작은 소모임, 연구모임도 좋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랑 연구모임이 현재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지만 서로 연계하는 활동은 적다고 합니다. 서로 연계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연(정외 06): 저도 동의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예술교육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시위주이기 때문에 사회문화환경지수를 높이려면 핀란드처럼 고퀄리티의 정립된 예술적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양업(정외 12): 제가 읽은 게 곽삼근교수님의 논문이었는데 정부정책보다는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길래 저도 동의합니다.

이민연(정외 06): 저도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주도해서 정부가 보조역할로 하는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준(정외 12): 요즘 미디어가 파워가 있잖아요. 미디어 주도 하에 독서를 하나의 큰 컨텐츠로 만들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양업(정외 12):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자본주의 4.0 에 대해서 기사를 시리즈로 많이 썼었는데 그런 것처럼 시민의식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측면에서의 특집기사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준(정외 12): 옛날 초등학교 바른생활 책처럼 딱딱한 것보다는 교육적 측면에서 좀 더 생생하고 체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연(정외 06): 아동 ADHD 가 지금 비율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이 친구들은 주의력결핍이라서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찾아서 따로 독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찬복(정외 08):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받는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직장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세대를 20-30 대라고 가정해보면 이 세대들은 IMF 를 겪은 세대고 대부분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해요. 청소년기때 외환위기를 겪다보니 시민의식보다는 물질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개인주의가 확대된 세대라고 해요. 이 세대가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고 앞으로 클 아이들도 이 세대 부모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텐데 이 세대의 개인주의가 물려진다면 시간이 지나면 더욱 시민의식이 선진화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인들의 교육, 회사에서 따로 교육을 하던가 사회환경캠페인 등과 같이 사회인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영화(정외 12): 그럼 정부에서 가정에서 같이 시민의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찬복(정외 08): 일단 정부에서는 가정 하나하나에 상대를 할 순 없지만 기업을 상대로는 강연을 필수화하라는 것을 통제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규영(정외 13): 미국에서는 조부모와 함께 책읽기라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윗세대가 먼저 독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갈 꺼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영화(정외 12): 우리나라는 지금 핵가족추세이기 때문에 조부모와 함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시민의식교육을 할 때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뿐만 아니라 회사원 가족들도 함께 듣는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최양업(정외 12): 근데 강연뿐만 아니고 강연 후에 행동주의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준(정외 12): 제대로 시민사회가 선진화되려면 현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양업(정외 12): 하지만 그런 시민사회의 병폐는 자체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이 선진화된다면 더욱 빨리 그런 문제점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민연(정외 06):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특성화하는 고교가 많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다양성과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예술을 전공해도 사회에서의 대접이 좋지 않아서 다시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한다고 해요. 예술 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찬복(정외 08): 하지만 그건 김대중 정부 때 한 번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것보다 더 거시적인 문제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나(정외 12): 조금 주제를 벗어나는 쪽으로 의견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독서율, 준법정신과 같은 공공도덕의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시행중이고 어떤 것들이 시행되었으면 좋을까요?

나영화(정외 12): 독서율 높이기 위해서 시청에서 열람실을 오픈했다고 해요.

최양업(정외 12): 근데 거기서 애들이 시끄럽게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찬복(정외 08): 그래서 애기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세대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양업(정외 12): 그 서울시청 도서관이 잘 운영되지 않는 것 보면은 정부차원에서 운영을 해도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소용없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나 시민단체에서나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민연(정외 06): TV 프로그램에서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예전의 방송과 같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지금의 부모들도 반성을 하고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찬복(정외 08): 극단적으로 공익캠페인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금연캠페인도 극단적인 사례를 보이듯이 시민의식을 위해서도 그런 문구를 써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민연(정외 06): 시민사회가 선진화된 국가를 보면 이미 선진화된 정치얘기보다는 예술적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사람들은 정치얘기를 하는 데 다른 국가들은 예술적 얘기를 하니까 국제적으로도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최양업(정외 12); 하지만 그건 국가별로 다르다고 해요. 경제가 좀 뒤처진 국가는 경제학회가 활발하고 인기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정치적으로 좀 선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이 더

활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굳이 다른국가에 맞추거나 애써 대화관심사를 바꿀 필욘 없을 것 같아요.

이민연(정외 06):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입법안을 굉장히 많이 내는데 그게 시민이익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위한 법안을 많다고 해요. 그런 의식들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영화(정외 12): 사촌오빠가 핀란드에서 살다왔는데 핀란드에서는 정치인이라고 높다는 인식보다는 주변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주민과 같다고 생각한대요. 그런 의식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양업(정외 12); 그런 의식이 생기려면 아까 말한 덴마크의 평생교육처럼 인문학 시민단체나 연구모임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찬복(정외 08):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시민단체가 너무 정치색이 강한 것 같아요. 다른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양업(정외 12); 곽삼근 교수님의 논문에도 보면 시민단체가 그런 학술단체와 연계가 적어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해요. 정치적 시민단체보다는 시민의식, 인문학 쪽의 다양한 시민단체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영화(정외 12): 일단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경제적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을 더 키워야 시민의식이 나아지는데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은 성장을 위해서 너무 물질주의적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경제상황이 된다면 그런 의식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찬복(정외 08): 하지만 경제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위기에도 잘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경제가 약해도 시민의식이 강한 다른국가의 사례에서 배워올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최양업(정외 12): 싱가폴같은 경우엔 국가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시민의식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나(정외 12): 지금까지 사회문화환경지수와 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준법정신도 사회문화환경지수에 포함되고 교육적 측면에서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준법정신의 함양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준(정외 12): 법질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디어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례를 크게 보도하니까 더욱 물질주의적 인식이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최양업(정외 12): 법 같은 걸 만들어도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고 법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처벌받는게 미약하다던지 하면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준법의식이 성장되지 않을 것 같아요. 법제도나 좀 더 꼼꼼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민연(정외 06): 준법정신에서는 가정교육도 중요할 것 같아요. '법을 지켜라'라고 무작정 제시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사소한 거라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법을 어기게 되면 그러면 안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나 법보다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에겐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이찬복(정외 08): 준법정신에서는 큰 죄도 문제가 되지만 경범죄같은 경우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담배꽁초 버리는 거, 무단횡단 이런 사소한 것부터 잘 지킬 필요가 있고 국가의 큰 행사 때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좀 더 경찰이나 정부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유나(정외 12): 네 학우분들 의견 잘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의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보자면 사회문화환경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한 캠페인, 시민단체의 주도적, 자발적, 적극적인 시민의식선진화를 위한 활동, 그리고 그런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고 유럽 시민의식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도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도 입시위주가 아닌 인성교육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 기업, 캠페인, 강연 등을 통해서 시민단체나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2 차 명지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 전문이었습니다.

②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한국은 국민성이 부지런하고 각 개인의 재능이 뛰어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정치민주화를 성취하는 등 어느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직성과 준법정신이 떨어지고, 남을 배려하는 관용의 태도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선진화를 향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적 시스템의 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의식, 즉 선진화된 시민의식의 함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이화여대 학생들과 모여 시민의식의 선진화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소은(중문,3) : 한국은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경제성장 만큼의 시민의식은 아직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한국이 완전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시민의식의 부재는 권위에 대한 부정, 법질서에 대한 파괴 등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시민의식의 부재 원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삼아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롤모델의 중요성과 자신이 생각하는 롤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법정신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심리,2): 우리나라는 아직 작은 법질서를 지키는 준법정신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하기는 자신은 법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실천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야만 전체적인 법질서가 수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직은 잘 지켜지지 않아 우리 사회에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은(일사,3): 저도 그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사회적 귀감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토론문 내용을 보았는데, 귀감이 될만한 대상을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 보다는 스스로가 잘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쓰레기 버리기나, 담배꽁초, 거리에 침 뱉기, 무단횡단, 신호위반과 같은 것에서 철저히 지킨다면 내 자신이 이웃과,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과정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주(심리,2):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식의 수준이 개개인이 지키고자 하는 수준이 되려면 아직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유지민(경영,4): 저도 여러분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사회적인 귀감이 될 수 있는 롤모델은 꼭 지도층이나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가 법 질서를 지킨다면 나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회적 귀감이 없어서 시민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윗물이 맑지 않아서 아랫물도 맑지 않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벌써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시민의식의 성장에 충분조건이긴 하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은(중문,3): 다음은 배려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배려정신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먼저 지나가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고 기다려 주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서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고 기다려 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현(경영,2): 어찌 보면 양보도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양보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양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에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등교를 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지하철에서 제가 겪은 바로는, 사람들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낀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부터 느낀 문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배려할 수 있었던 일을 지나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국민들의 배려에 대한 의식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은(일사,2): 배려와 같은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교육이나, 환경적으로 배우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는 인격의 기본적인 소양인데, 그것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교육적인 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려도 다른 여러 시민의식과 마찬가지로 교육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송희연(통계,4): 저는 우리 사회에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 부족에 대한 이유 중 한가지는 학생시절부터 욕하는 문화, 막말문화가 뿌리깊게 박혀서 남에게 배려 없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대할 때 막하게 되고, 그것이 배려가 부족한 우리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소은(중문 3):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시민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롤모델은 누구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현(경영,2): 저는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성경책과 종교적인 서적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에 관해 그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 책도 많이 읽었는데, 그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 봉사정신은 가히 현대사회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배려가 부족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와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의 배려는 더욱더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롤모델로 한다고 해서 꼭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의 인간으로서의 삶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충분히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십자가에 못박히기 전, 자신을 잡으러 왔다가 유다의 칼에 귀가 잘리고 다친 병사들에게 치유를 행하고 자신의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말했던 예수님의 아가페정신은 현대사회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유지민(경영,4): 발제문과, 보내주신 칼럼을 읽어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도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롤모델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지만, 칼럼 작성자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꼭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롤모델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학교 앞에서 빅이슈 잡지를 판매하시는 아저씨에게 우리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아저씨의 꿈을 위해 바이올린을 선물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기사가 나기 전,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그 이야기가 알려졌었고, 그 이후 빅이슈 잡지에 대한 관심과 홈리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었습니다.

꼭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일이고 그것이 알려질 수 있는 장치만 마련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의 선행이나 솔선수범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희연(통계,4):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동안 우리학교 내에서 이번 빅이슈 아저씨에 대한 학생들의 선행뿐만이 아니더라도, 종종 있어왔던 학생들의 미담이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서 본다면 앞선 선행들이 롤모델이 되어 현재 학생들이 하고 있는 선행활동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롤모델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③ 총신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사회자: 한국 사회는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화를 향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화에 걸맞는 성숙한 사회의 실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사회는 정직, 배려, 준법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물질적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앞서는 가치관의 전도로 인해 시민의식이 실종되었고 일종의 '한국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병을 치유하지 않고는 진정한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총신대학교 연구모임에서는 한국선진화포럼 제 73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 '시민의식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에서 아쉬운 점과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교육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한국사회의 시민의식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작은 에피소드부터 언론매체를 통해 본 지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요한(사복 2): 지적 장애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학생이 봉사왕이라는 명분으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합격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대전지역 명문이라는 고등학교의 남학생들이 지적 장애 여학생을 한달 여간이나 집단 성폭행한 것도 기가찬 노릇인데 소년보호 처분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숨긴 채 봉사정신이 투철한 봉사왕이라고 추천서를 써준 학교측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은 학생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내면의 가치보다 외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송수진(신학 2):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전국의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재학시절 저희 학급에 장애인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학교의 시설 때문이라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장애인도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고 사랑 받아야 할 대상임을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는 누구나 불시에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더 이상 장애를 남의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의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훈(유교 2):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거짓말이나 불법을 통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 젊은이들이 10 명 중 4 명꼴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죠. 저는 우리사회에 정직이라는 덕목이 메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화 되기 이전 사회로 돌아가서 유럽과 같이 정직함을 강조하는 나라는 자기의 노력에 따라 부자가 되는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아니면 귀족이나 왕족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부자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나.

그런데 우리나라의 몇몇 재벌이나 부자들을 보면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벌음으로써 일반시민에게도 모범이 되지 않고, '저 사람도 저렇게 부자가 되는데'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자꾸 비춰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무감각해지고 비정직한 행동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한국사회에 내재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소위 성공한 재벌들 가운데 정직이라는 덕목으로 우리들의 귀감이 될만한 마땅한 롤모델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박이삭(사복 3):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예전에 비해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근대화 이후 백년 뒤에야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선진국들도 이러한 과정을 차근차근 거쳐왔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우리나라 시민의식 현주소와 관련하여 다양한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학생의 인격적 성숙보다 대학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현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회, 그리고 정직함의 가치보다 부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 등 우리사회 곳곳의 다양한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박이삭 학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냈고 그 가운데 물질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인간적인 가치가 소홀하게 여겨지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이 토론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홍예지(아동 3): 저도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박이삭 학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국이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오랜 기간 정착된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그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짧았기 때문에 시민의식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일제강점기 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제강점기 때 불법적인 부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왔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쌓여가다 보니 이제는 고위관료들의 비리나 사회의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무뎌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유명인들 중에도 훌륭하고 존경 받을만한 사람이다 생각될 때 쯤이면 논문 표절, 각 종 비리가 터지면서 논란이 되잖아요.

잘못에 대해 눈감아주는 태도가 비일비재해지면서 현재의 시민의식이 이정도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미래세대에도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현빈(아동 2): 역사적 맥락에서 시민의식이 저하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의식의 문제를 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나 쩍벌남! 지난번 시청에서 싸이 무료 콘서트를 할 때 시민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서 논란이 됐었던 것이라던지, 한강에서 불꽃축제 후 그 주변이 쓰레기더미가 되었던지 하는 사소한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사회의 거시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들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다민(역교 1):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본 사진이 있어요. 제목은 '500 년 전 해시계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한심한 시민들'. 해시계 속에 담배 갑이며 온갖 쓰레기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우리 자산 해시계를 감탄의 모습으로 바라보지는 못할 망정, 움푹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쓰레기를 담아 놓은 것을 보고 우리나라 시민의식 수준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수진(아동 4): 저도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서울 시내에서 언젠가부터 쓰레기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95 년 종량제를 도입한 후, 가정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속출하면서 쓰레기통을 줄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마련되어 있다면 시민들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측면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재훈(유교 2): 제가 싱가폴에 사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싱가폴도 해방 후 빠른시간 성장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다른나라의 자본을 많이 끌어들인 나라잖아요. 기술적으로나 자본적으로나 선진화 된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성숙도는 아직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법 또는 벌금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실제로 싱가폴에서는 벌금 규제가 정말 다양하고 철저해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한국이랑 중국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와 싱가폴은 경제성장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싱가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낮다는 것을 캐치하고 강력한 규제를 썼고 우리나라는 규제의 정도가 미비하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싱가폴과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노지애(유교 3): 저는 시민의식이라는 말을 듣고 딱 생각나는 것이 지하철 막말녀였어요. 젊은 여자가 할머니에게 반말을 하며 욕을 하는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직접 찾아보니 이런 종류의 동영상이 한 두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국의 영상도 보았는데요, 중국에는 속옷녀가 있더라구요. 지하철에 속옷만 입고 타는 여성의 영상인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옆 나라 일본의 경우, 지하철을 타면 휴대폰은 항상 진동모드로 하고 일부 지하철에서는 DMB 가 아예 켜지지 않도록 되어있다고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김재훈 학우님의 말씀대로 어쩌면 법을 통한 규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수진(아동 4):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바탕에서 예의범절과 효 사상을 사람됨의 근본으로 삼고 살았는데요, 그런 우리의 좋은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학교현장만 보아도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졌고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심지어 자식이 게임을 못하게 했다고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윗어른에 대한 공경이나 존중은 찾아볼 수가 없고 각자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사회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박이삭(사복 3):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유교문화가 바뀌게 된 계기는 IMF 때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돈에 대해서 지금처럼 숭상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절엔 나름대로 성실히 일을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IMF 이전에는 서로가 함께하는 사회였는데 IMF 가 들어서면서 극심한 경쟁사회가 된 것이죠. 내가 살려면 남이 죽어야 하는 개인주의가 된 것이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으로 인정받는 세상이다 보니 예의와 같은 인간적인 가치보다 무조건 돈이 중심이 된거죠. 이렇게 삶이 각박하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무의식 중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의 대부분이 이런 분노의 표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재훈(유교 2): IMF 를 통해 회사에 대한 불신, 내가 일하는 직장에 대한 불안정성도 사람들의 의식변화에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회사가 나를 책임질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회사가 나를 버리는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도 회사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안 뒤로는 자기가 자기 돈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는거죠. 회사는 망하더라도 나는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도 경제적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일본은 '사장이 돈을 적게 벌어도 다같이 살아야 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사회에서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외적으로는 극복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내가 살아야 한다'는 개인주의가 더 만연해진 것이라 생각해요.

홍예지(아동 3):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철에서 개념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예전에는 그래도 이러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사람들이 각박한 삶 속에서 가치의 정립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이 우선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사회가 저출산 사회가 됐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비교적 오냐오냐 키우게 됐죠. 심지어 학교에서도 학생인권을 이유로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체벌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회자: 우리 나라 시민의식의 현주소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기 위해선 사소한 개인의 의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전체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할텔데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데에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해요. 발제하신 박일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가치의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알고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제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시민의식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애(유교 3):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느 유명한 학원의 광고를 봤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넌 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시간이 많아질거야. 그럴 때마다 네가 계획한 공부는 하루하루 뒤로 밀려지겠지. 그런데 어쩌지? 수능 날짜는 뒤로 미뤄지지 않아. 벌써부터 흔들리지마.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 주지 않아.' 친구를 함께 어울리는 친구가 아닌 경계해야 할 경쟁상대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현장을 보면 사교육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교육에서도 대학가기 위한 공부만을 하고 있어요.

송수진(신학 2): 우리 사회엔 자기 특성을 찾아주는 공부가 아니라 서열화시키는 공부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사회가 다원사회라고 하지만 성적으로 줄세워진 일원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잘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손실인 것 같아요. 지금 학교 현장에선 주요과목에 밀려 예체능 과목 심지어는 윤리나 역사과목까지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예지(아동 3):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가 과잉경쟁이 아닐까 싶어요.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스터디 그룹을 통해 모르는 것을 서로 도와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여러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배워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옆 사람이 경쟁자이다 보니 협력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공부는 아예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김재훈(유교 2): 서울 사대에 다니는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학교 고시반에서는 옆 사람이랑 정말로 단 한 마디도 안한대요. 요새 워낙 TO 가 적잖아요. 정보공유도 전혀 없고 혼자 밥 먹으면서 혼자 공부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친구만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20 대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삭막한 현실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지 걱정이 들더라구요.

김지윤(역교 1) : 우리 사회가 그저 자기살기도 바쁘다 보니 자기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을 되돌아 볼 마음의 여유도 없어진 것 같아요. 삶의 여유가 없으니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 보다는 문제가 있어도 덮어버리려고 하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성폭력, 학교폭력 문제가 나타나도 잠시 논란이 될 뿐, 고쳐나가자고 생각하기 보다는 묻으려고 하잖아요.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삶의 여유도 필요하겠죠.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을 학교현장에서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하겠죠.

박이삭(사복 3): 시민의식의 선진화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잖아요. 행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이 많이 나온다 한들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요. 바른 덕목들을 잘 가르쳤다면 그것을 실천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홍예지(아동 3): 동의합니다. 말만 선진화 한다고 선진화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시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저는 우리 사회가 귀감이 될 만한 인물들을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만 같아도 어린이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하고 물으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등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에게 '누구 존경하니?'하고 물으면 존경하는 인물은 커녕 하다못해 엄마라는 말도 안나오거든요.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귀감이 될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사건, 인물들을 많이 발굴해내어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다민(역교 1): 시민의식 논란이 확산되는 점에는 SNS 의 발달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상식 외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지금은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바로 찍어 공유해서 이슈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역으로 SNS 를 통해 시민의식을 일깨어줄 수 있는 감동적인 컨텐츠를 많이 확산시켜나간다면 교육적 효과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요한(사복 2): 우리나라 교육의 커리큘럼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 캐나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데요, 북미, 서구 쪽을 보면 학교에서는 대학을 가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좋아하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강조해요. 학교 과목도 다양해요. 목공, 자동차 수리, 미술, 수영, 양궁 등의 다양한 과목이 정규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대학교처럼 수강신청을 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을 좀 더 일찍 찾아 발전시킬 수 있죠.

대학 진학률을 봐도 20%도 채 안돼요. 한국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학에 나와도 취업이 잘 되지도 않는 환경 속에서 말이죠. 캐나다는 자신의 기술 하나로 평생 직장을 갖고 그러니 삶의 만족도도 높아요. 삶의 만족도가 높으니 생활 속에 여유가 넘치고 여유가 넘치니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이 가능해져요.

학교 프로그램에서도 'donation' 기부행사라고 해서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 안 쓰는 것들을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킴으로써 시민의식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서열화시키고 있고 대학가는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육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예지(아동 3): 지난 학기 교양과목으로 '평생사회와 학교교육'을 들으면서 독일의 교육현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독일도 말씀해주신 캐나다처럼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아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김나지움(Gymnasium) 고등학교에 다니고요, 그 외에 학생은 직업학교, 실업학교에 다니게 되요. 직업학교에서도 심화과정, 전문과정 등으로 다양한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인문계, 실업계로 나뉘어 있지만 실업계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학입시가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좀 더 수평적 교육의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이삭(사복 3): 우리나라가 개인의 잠재력을 살리는 교육이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사람들이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 안나오면 취직이 안되잖아요.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고 대졸자와 임금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대학을 가려고 하는거죠. 그런데 단지 대학에 가기만하면 안되고 명문 대학을 가야하잖아요.

대학이 취업과 연결되어 있으니 좋은 대학을 위해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야 하고, 고등학교 때 잘하려면,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잘해야 하는거죠. 결국 사회 전체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쪽 고등학교에서 캐나다, 독일과 같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고 싶어도, 저쪽 고등학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간다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질게 분명하구요. 그럼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거세잖아요. 결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의 변화를 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재훈(유교 2): 일본의 경우 와(和)정신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신의 반경을 설정하여 '나는 이만큼만 채우면 된다'라는 거죠. 일본인들은 내 그릇이 작다고 생각하면 내가 저임금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잘살려고 하잖아요. 남이 못살아도 일단 나는 잘살고 봐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너무 의식해요.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하려는 의식이 강하죠. 일본은 '내가 못 살아도 우리 나라가 살자'라는 식인데 말이죠.

김지윤(역교 1): 우리는 지금 영웅이 각광받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소위 성공했다, 유명하다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인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내려놓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되지 못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치들이 우선이 되어 살다보면 내가 어느새 행복하고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게 평가 받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재훈(유교 3): 일본의 경우,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마렴, 너의 삶에 만족하면 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넌 성공해야 해, 넌 잘 살아야 해'잖아요. 우리나라도 가치 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등의 올바른 가치 기준을 각자가 설정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현빈(아동 2): 그렇지만 지금 학교나 가장에서의 교육환경이 학생들이 그런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법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킨다고 해서 체벌을 금지시키는 등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됐잖아요. 교사의 권위나 학생들의 도덕성은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물론 체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법이 아닌 윤리적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쪽으로 제정 된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예지(아동 3): 어렸을 때부터 윤리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라바' 같은 만화를 제작할 때 에피소드에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녹여내는 거에요. 아이들이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접하면서 자라다 보면 무의식적으로도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교육에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공익광고도 그렇고요, 사건 사고만 중요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비춰주었으면 좋겠어요.

조현빈(아동 2): 시스터라는 영화를 보면 한 소년이 나오는데 스키장에서 스키를 훔쳐 판 돈으로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이 소년은 훔친 스키를 팔아 돈을 갖다 주는 것이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를 영화에서는 어머니의 부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가난에 대한 상처 때문에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복지가 잘 이루어져야겠죠. 사회 범죄자들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실직과 가정의 해체와 같은 개인의 아픔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불운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겠죠.

사회자: '시민의식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민의식의 현주소와 원인,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물질적 가치만을 우선시한 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가치에는 소홀해 왔던 것은 아니였는지 반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가치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닌 배려의 마음을, 자기 반성을 통해 좋은 습관을 내재화할 수 있는 실천적 자세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잠재력과 개성이 책임감을 전제로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④ 아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홍용남(미디어 3) : 제 73 차 월례토론회에서 진행되었던 “시민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시민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정의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병현(산업디자인 2) : 저는 선진화포럼의 월례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여 토론을 지켜봤는데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배후에 국민들의 시민의식 함양 부족으로 인한 것들이 많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문화지체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기술적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지만, 국민들의 윤리의식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훈(사회 4) : 글쎄요, 저는 경병현 학생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시민의식의 부족이란 것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각 국가마다 특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시민의식이 옳다고 정의 내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국가마다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거쳤는데 시민의식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것 아닌가요?

김상원(예술 2) : 최재훈 학생의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법이란 것도 절대적인 영역이 아닌 것 아닌가요?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법이란 게 생겨났다고 봅니다. 시민의식도 마찬가지로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묵시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막장’ 시리즈가 올라오면 큰 인기를 끄는 이유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막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동일하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민의식을 절대적 개념화시킬 수 없다는 말에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박정현(산업디자인 4) : 저는 홍용남 학생의 칼럼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한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의 조급한 성미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남다른 욕심도 한몫 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선, 김상원 학생이 말한 것과 같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바꿀 수 있다면 한 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홍용남 (미디어 3) : 각자가 시민의식에 대한 개념자체를 달리 정의하고 있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토론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시민의식은 다르지만, 우리 사회가 결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상원(예술 2) :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대해 여유를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먼저 신경쓸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이기적인 풍토가 장려되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학교나 직장에 다닙니다. 학교나 직장이 어떤 곳입니까? 정글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경쟁이 장려된단 말입니다. 대다수의 시간을 경쟁하는 데 보낸 시민들이 어떻게 다른 장소에선 이타적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회구조적 문제가 우리 시민의식을 퇴보시키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결코 단기간에 바뀔 수 없다고 봅니다.

경병현(산업디자인 2) : 경쟁이 장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학교나 직장이 경쟁을 장려한다고 해서 시민의식이 퇴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한 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시민의식의 퇴보가 우리나라의 윤리교육이 지나치게 부실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윤리에 대한 토론한 번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도덕과 윤리 교과서를 공부하지만, 왜 어떠한 행동은 도덕적 행동이 됐고 어떤 것은 악행이 됐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윤리마저도 주입식으로 교육하려는 대한민국 윤리교육의 부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최재훈(사회학 4) : 그 부분에 있어선, 경병현 학생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는 데 교육과정의 변화는 아주 미미합니다. 윤리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과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 고등학교를 의무교육과정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사회화를 돕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중,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윤리적으로 변했습니까?



홍용남(미디어학부 3) : 시민의식의 퇴보 문제가, 윤리교육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군요.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 만약, 윤리교육 문제가 해결되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윤리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다 자라난 어른들이 윤리교육을 다시 받을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세대가 교체될 때까지 우리 시민의식, 포기해야 할까요?

박정현(산업디자인 4) : 재미있군요. 기성세대의 시민의식 문제는 윤리교육만으로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저는 기성세대의 시민의식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최근 기업들이 앞다퉈 기업 내 도덕적 문제를 관리하는 부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 C&C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서들로 인해 실제로도 많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병현(산업디자인 2) : 공감합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라는 말 듣고 양보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하지만 노약자 전용석에는 아무도 앉지 않죠.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따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암묵적으로 모두가 합의를 하죠. 시스템의 개선이 시민의식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상원(예술 2) : 물론, 시민들을 윤리적 행동을 하게 시스템을 설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뤄진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비도덕적 행위에 벌금을 부과하여 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초적으로 시민들이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시민의식의 선진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데요.

경병현(산업디자인 2) :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노약자 전용석에 아무도 앉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짜 도덕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개인의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도덕적 행동이 어떠한 암묵적 합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발적인 행동이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딱 잘라서 정의내릴 수 없거든요.

김상원(예술 2) : 글쎄요, 저는 응용도가 높은 진정한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해선 국민 의식 자체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엽적인 영역에서 도덕적 행위를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아지진 않을 것 같네요.

홍용남(미디어학부 3) : 시민의식의 '진짜' 선진화와 '가짜' 선진화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진짜'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박정현(산업디자인 4) :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국민정신건강 2030'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2030 년이 되기 전까지, 국민의식이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의 시스템적 개선이 있어야겠습니다. 가령, 학교폭력이 문제라면 학교폭력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모든 교내에 CCTV 를 설치하면 되고, 승강장의 새치기가 문제라면 새치기가 발생할 수 없도록 줄을 서는 곳을 복층 구조로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식으로 비도덕적 행동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하나 둘 만들어간다면,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병현(산업디자인 2) : 저는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윤리토론 과목의 신설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윤리를 글로 배우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간에 윤리적 논제에 대해 토론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을 신설할 때입니다. 윤리토론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수강 전과 후과 완벽하게 다를 것입니다. 도덕의 개념을 체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훈(사회 4): 경병현 학생과 의견을 함께합니다. 윤리교육의 변화만이 우리나라가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윤리관련 교과목의 전면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상원(산업디자인 2): 현재 SNS 를 통해 시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도덕적 행위에 대한 합의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국민들 개개인이 서로에 대한 윤리적 감시를 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의식 퇴보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용남(미디어 4)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시민의식 선진화'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각자가 가진 시민의식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더욱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한 윤리교육의 전면적 개편이나, SNS 를 통한 시민들 사이의 자발적 감시망 형성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한 층 더 성숙해질 날을 기대해봅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화 과제 24: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사회에도 존재하는가

(제 67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강소라(서울여자대학교 콘텐츠디자인학과)

이 사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 80 대 20 의 사회로 나뉘어 80 은 20 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사이에 놓여있는 사다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누구나 신분상승을 꿈꾼다.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신분상승 사다리의 대표주자 사법고시가 로스쿨로 대체되면서 말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이제껏 사법고시로 유지돼 왔다. 즉 누구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의 관문을 거쳐야만 했다. 응시자에게 기회의 평등은 주어졌다. 과거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자식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될 때 많이 쓰였다. 사법고시라는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법조인으로의 신분상승은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사법고시제도가 로스쿨제도로 대체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 양성과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이 제도는 미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모티브로 삼은 것이다.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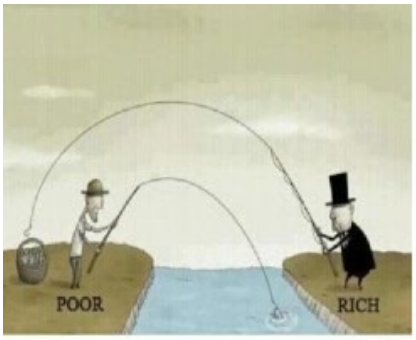
하지만 문제는 바로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과거에는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을 통해서 법조인으로 신분상승이 가능하지만, 로스쿨제도 하에서는 막대한 등록금을 3 년 6 학기 동안 들여야 한다. 저렴하다고 하는 로스쿨조차도 한 학기 등록금은 1000 만원에 육박한다. 많은 법학도들은 외친다. “법조인의 꿈이 있어도 돈 없으면 되지 말라는 것이냐!”

주요 로스쿨 장학금 수혜율 (단위:%)

학교명	전액 장학금 수혜율	학교명	전액 장학금 수혜율
건국대	50	서강대	37
경희대	10	서울대	25.2
고려대	33	성균관대	37.3
연세대	32	중앙대	55
원광대	67	한국외대	50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 돈이라는 문제가 개입하면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흔들리는 경우는 법조인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신분상승에 부(富)의 문제가 결합되면서 사람들의 신분상승의 꿈을 유리천장으로 막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신분상승에 있어 부의 결합은 떼기 힘든 문제다. 다만 국가 정책을 통한 극복은 가능하다. 앞서 예를 들었던 로스쿨제도를 생각해 보자.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제도나 저금리 등록금 대출제도를 통해 신분상승과 부의 결합문제를 완화, 또는 해결할 수 있다. 돈 없는 학생도 로스쿨 과정을 배울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국가가 등록금을 전폭 지원해 주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다. 신분상승은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현재 개인의 노력은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 세대는 열정적이다. 자신의 꿈을 위한 노력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국가의 노력이다. 국가가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튼튼하게 세우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는 노력에 의해 보상받는 진정한 자유국가가 되리라 믿는다.

② 김재원(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지난 7 월 26 일, 제 67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사회에도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방학을 마치고 얼마 전 9 월 13 일에는 숭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신분상승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신분상승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실 신분상승이라는 말은 근래에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고등학교 교과과정 중 사회과목에 보면 신분상승의 수평적, 수직적 이동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수평적 이동은 아버지가 어업을 하셨을 경우에 자녀 세대도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고, 수직적 이동은 아버지가 어업을 하셨을 경우 그보다 좀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평적 이동보다는 수직적 이동이 신분상승이라는 표현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직적 이동 즉 신분상승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물론”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간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신분상승의 성공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른바 부유층과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이 그것인데, 병폐적 사회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세습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신분상승은 쉽지 않은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볼 수 있다. 특히 얼마 전 발표된 OECD 국가 중 자살률에서 1 위를 차지한 건 신분 고착화와도 관련됨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경제민주화라 하여 재벌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정책이 이슈화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라는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기도 한다. 경제민주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복지정책과 경기부양책 등은 신분상승을 저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턱대고 시장에 맡기는 시스템은 그들이 효율성을 주장하지만 비효율의 극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된다. 사실 신분이라는 말 역시 가진 자들이 만든 하나의 기득권을 표현하는 말로, 평등적 사상에 기반하여 본다면 적나라하게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방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인식의 전환은 물론이고 가시적인 정책들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맹목적으로 대기업만 바라본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있다. 그러나 청춘과 자유를 버려가면서 대기업에만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분위기를 만든 사회 풍토 역시 정부는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신분상승이라는 표현은 그만 사용하고 보다 자유로운 계층이동이 가능한 한국을 기대해본다.

③ 김정원(경북대학교 경영학부)

한국 드라마에선 의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이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전문직 종사자인 그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뛰어난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의사와 변호사를 꿈의 직업으로 꿈꿔봤을 겁니다.



〈MBC 드라마 '골든타임' 중〉

2012 년 현재도 학생들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직업 순위에서 의사와 변호사는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7 위와 학부모 선호직업 3 위에 오를 만큼 아직도 인기가 많은 직업입니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1980, 1990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의대 진학과 법대 진학은 성공의 보장길이였습니다. 가난한 집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와 법대에 진학하면 그것이야 말로 제천에서 용 나는 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문직은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전문직에서도 불황의 그림자가 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의사와 변호사가 늘어난다는 소식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현황을 알기 위해 우선 가까운 동네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줄줄이 망하는 병원들

제가 사는 동네 인근(대구 달서구) 큰 도로의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다음 역까지 몇 개의 병원이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기준 지하철은 진천역이며 다음 역인 월배역까지의 거리는 768m 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도〉

도로 주변에 위치한 병원만 조사했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에 더 많은 병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반경이 아님) 길을 따라가면서 조사해본 결과 1km 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49 개의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한의원이 12 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치과 11 개, 내과 7 개, 피부과 6 개, 규모가 큰 병원 3 개 등 엄청난 수의 병원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2011 년도 병원의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6542 개의 병원이 개업하고 5275 개의 병원이 폐업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병원이 많이 폐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종별 개폐업 현황

(단위 : 기관)

종별	2011	
	신규	폐업
총합계	6,542	5,275
종합병원급	13	12
병원	200	140
요양병원	237	116
의원	2,030	1,662
치과병원	30	22
치과의원	1,107	730
조산원	-	6
보건소	-	-
보건지소	8	10
보건진료소	5	4
약국	1,666	1,683
한방병원	43	27
한의원	1,203	863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선, 병원이 너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병원이 한 곳에 있다 보니 이익이 분산되고, 초기에 임차료·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병원을 수억원을 빌려 차리다보니 결국 빚이 늘어나 폐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 환자들이 미용이나 건강유지처럼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진료는 덜 찾게 되는 것도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다양한 기능성 건강식품이 쏟아지면서 보약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어 한의원도 줄줄이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 시도별 개폐업 현황(종별)

(단위 : 기관)

시도	2011	
	신규	폐업
총합계	6,542	5,275
서울	1,702	1,651
부산	487	382
인천	318	236
대구	307	216
광주	234	181
대전	199	159
울산	126	86
경기	1,543	1,171
강원	136	127
충북	183	121
충남	263	185
전북	214	155
전남	198	123
경북	228	179
경남	345	262
제주	59	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개원의사들과 중소병원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위기의 근본 원인은 낮은 수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건강복지 차원에서 병원의 수는 증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도별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쪽으로 너무 몰리다 보니 다른 지역은 건강복지에서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도 마찬가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집계된 휴업변호사 수는 17.6%인 2507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도 32.6%인 4880 명입니다. 휴업하는 변호사, 회계사가 많아지는 이유는 신규 인력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부동산 분쟁도 줄어들어서 변호사들에게 큰타격을 입혔고, 회계사들도 경기침체로 대기업의 신규투자가 줄어들자 일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문직, 이제 해답은 아니다.

이렇듯 전문직도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아닙니다. 변호사, 회계사는 공급과잉으로 치열한 경쟁체제가 되었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사'자 직업으로 되기만 한다면 큰소리 뻥뻥칠 수 있었던 전문직들. 지금은 그들에게도 자본주의의 원리가 파고들어 경쟁과 친절서비스가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고시촌에서 밤을 지새우며 전문직의 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야를 넓힐 때입니다. 전문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어떨까요?

④ 김화랑(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출처: http://analytikainc.com/blog/2010/12/17/education-as-a-motivator/〉

교육백년지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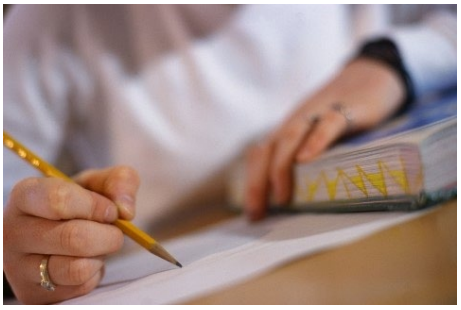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일컫는다. 국가를 떠받칠 인재를 키우는 교육은 백 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 같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연에서 자원 하나 나지 않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도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를 짊어질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계발과 과학기술의 진흥이
국력을 키움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위 내용이 그대로 모든 교과서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내용을 우리는 학창시절에 수도 없이 보았을 것이다. 천연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는 1960 년대부터 시작된 경제발전 및 기업성장을 위해 인적자원 관리를 매우 중요시하였고, 인적자원 관리의 기반이 되는 교육에 대한 정책이 언제나 큰 이슈가 되었다. (지난 10 월 칼럼에서 '이공계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썼기에 '과학기술의 진흥'에 대해서는 이번 칼럼에서는 다루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21 세기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혹자들은 되돌리기 힘들다는 말까지 하곤 한다. 왜 교육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정녕 없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입시정책을 겪은 대학생들의 토론과 이와 더불어 자료조사로부터 알아보기로 하였다. 먼저 대학생들의 의견은 하나 같이 한국의 교육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첫째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만 교육정책을 내놓고, 둘째 기득권층에 너무나 유리하게 변화하였고, 셋째 점점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칭 교육전문가라는 이들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당장 눈 앞의 문제만 탈피하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고질적으로 박혀있는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 기반이 되는 제도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제 대학생들이 꼽은 한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의 각 이유에 대해 하나 하나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일단 이에 앞서 대학생들은 한국의 교육정책을 크게 입시정책과 교육복지정책 두 가지로 나누어 의견을 공유하였고, 입시정책 또한 교육복지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교육복지정책 자체가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인 10~20 대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bwNX&articleno=64&_bloghome_menu=recenttext#ajax_history_home〉

서문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썼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백 년은커녕 오 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수 차례 이것저것을 추가하고 제거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나 행정은 근시안적이고 개편이 잦은 형태로 일관되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광복 직후에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정, 재정의 궁핍, 급속한 인구성장 및 교육의 팽창 등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에 따라 교육의 건전한 성장이 어려운 조건 때문이었다고 보지만 지금 21 세기는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니다. 너무 잦은 교육과정의 변화, 수능체제의 난이도 조절 실패, 도입된 등급제의 허술함으로 인한 문제, 한국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 받는 대입전형인 정시비율 축소, 갑작스러운 입학사정관제 도입, 불공정한 입시정책으로 언급되는 재외국민 전형의 확대,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취지와는 반대되는 입시 결과 등 이들 모두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내놓은 교육정책으로 인한 문제들이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교육에 대해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들이 외국의 좋은 입시제도라며 들여온 것들이다.

수능체제가 도입 된지 10 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수시가 도입되었고, 현재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전형은 그 비율이 수 년 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되며 한국의 교과과정을 얼마나 잘 이수했는지를 알아보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이만큼이나 공신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수시 도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갑작스럽게 입학사정관제를 입시정책으로

도입하였으며, 다음 해부터 1 년에 1 번 치르는 수능을 2 번 치르겠다고 하는 등 교육전문가라는 이들의 한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험은 방향성이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험정신은 좋으나 이로 인해 피해보는 이들이 바로 한국을 앞으로 짊어지고 갈 현 10 대, 20 대들이다. 예컨대, 저소득층을 위한답시고 EBS 를 연계해서 수능 문제를 출제한 뒤 어떻게 되었나? 취지대로 저소득층, 지방인들의 명문대 입학 비율이 높아졌을까? 대학은 수능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져 수능 결과로는 입시생들의 수준을 분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시 비율을 늘리게 되었고, 갑자기 도입된 수시에 대한 대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들은 자본을 가진 잘 사는 집의 자제들이 되었으며,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에 비해 더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정책'이라는 주제의 한국 교육전문가들의 실험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점점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모습이다.



〈출처: http://www.afreeeducation.com/〉

첫째 이유는 결과적으로 둘째 이유인 기득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점점 변모한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교육정책을 내놓는 이들은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점점 잘 사는 집의 학생들이 명문대학교라 불리는 곳을 많이 가는 것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정치와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하나의 함수관계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올바르고 안정된 교육의 진로를 찾기 어렵다는 것은 지나가던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점점 학문을 위한 대학이 아닌 학벌을 위한 대학이 되어가는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안타까운 현상 중 하나이다.

서울지역 서울대 입학생의 65% = 특목고 + 강남 3 구

한국의 대학서열 중 최고 순위에 위치한 서울대를 예로 들어보자.서울대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그렇게나 교육열이 뜨겁다고 뉴스나 신문에서 수 년 전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정도인 '강남'이란 단어가 등장하였다. 점점 서울대를 보는 서울지역 학생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지역에서도 또 구마다 차이를 보인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veritas_news/30150853726〉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통계 자료를 찾아보았다. 약 1 달 전인 2012 년 11 월 5 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철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와 기회형평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2011 년 서울대 입학생의 65.7%가 서울 내 15 개 특목고 출신이거나 강남·서초·송파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강남 3 구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a 를 보면, 서울대 입학생 중 특목고 출신은 지난 1999 년에는 26.3%였지만 2002 년 22.8% 2005 년 28.5% 2008 년 31.5% 2011 년 40.5%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목고와 강남 3 구에 우수 3 구(양천·광진·강동) 출신비율을 합한 이들의 입학 비중 또한 1999 년 67.1%에서 2011 년 74.3%로 10 여 년 만에 7.2%포인트나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011 년 기준 서울지역 서울대 입학생 10 명 중 7~8 명이 특목고 혹은 상위 6 개 구 출신인 셈이다. 반면 나머지 19 개 구 출신 학생의 입학 비중은 1999 년 32.9%에서 2011 년 25.5%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그림 b 에서 지역구별로 매우 급격한 차이를 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울대 전체 입학생 중 서울지역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 확인을 마쳤으므로 논리적으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하려 한다. 글을 읽고 이들의 노력을 폄하한다는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에 미리 밝히자면, 필자는 지방 특목고 출신이고, 현재 서울대에 재학 중이다. 들은 바, 겪은 바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 전달을 할 것이다. 특목고를 간 후 서울대 및 타 명문대를 진학한 학생들이나 강남 3 구 출신의 서울대 및 타 명문대 입학생은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고 노력을 들인다. 필자 또한 사교육을 전혀 안 받은 것도 아니지만, 서울·경기 지역 특목고 출신 동기와 비교하였을 때 대입 준비에 있어서 지방은 시스템 상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문대에 진학한 이들이 공부의 목적이 학문이든 학벌이든 더 나아가 개인의 성공이든 무엇이든 간에, 평균적으로 남들에 비해 일찍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부지런히 노력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입시정책에는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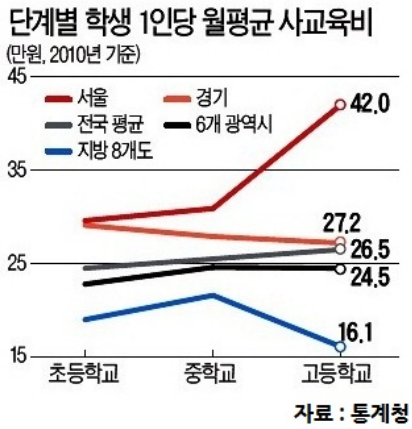
〈출처: http://blog.naver.com/bulja200/30150877943〉

위 그림은 앞서 첨부한 그림 a 를 2002 년과 2011 년만을 비교해서 나타낸 그래프이다. 특목고, 강남 3 구, 우수 3 구의 서울대 입학생 비율의 확연한 증가폭을 알 수 있다. 대학 입학에는 학업성취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대입 전형은 수능 외에도 입학사정관·내신·수상 경력·구술 면접·논술 등 많은 전형이 존재한다. 점점 특목고와 강남 3 구, 우수 3 구의 입학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곳에 사는 그들이 이러한 전형을 쉽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부유층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남들에 비해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일단 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졌고 더 노력을 함에 있어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문제 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별 진학 격차가 거주지 학습환경과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고 보고 그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수능 등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거주지의 학습환경지수(학교 주변 환경·수업 분위기·학부모 경제적 상태·주변 학교와 비교한 학생 성적 등을 지수화, 5 점 만점)에서 1 점 낮아짐에 따라 수능 등급은 0.43 등급 하락함을 볼 수 있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친의 직업·학력·소득으로 구성)가 10 분위에서 1 분위 떨어질 때마다 수능 등급은 0.06 등급만큼 하락했다. 다음으로 4 년제 대학에 진학할 확률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거주지 학습환경지수가 1 점 낮아지면 4 년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9.9%포인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1 분위 하락하면 4.5%포인트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도권(서울·경기) 지역의 학생들과 지방 학생들의 진학 격차도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2010 년 통계청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이 받는 사교육비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비해 경기지역과 6 개 광역시는 거의 유지, 지방 8 개도는 중학교 때 잠시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때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사교육비의 양 또한 서울·경기 지역이 지방에 비해 훨씬 앞서는 것을 위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다. 더불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 년부터 2011 년 사이 고등학교 졸업생 1 만명당 서울대 진학률은 서울 지역의 경우 90.3 명에서 94.9 명으로 늘어났고 경기지역도 31.2 명에서 39.6 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 6 개 광역시의 진학률은 69.9 명에서 42.7 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지방 8 개도 38.6 명에서 37.4 명으로 떨어졌다. 서울대 진학률의 전국 평균치와 비교한 '상대진학률'은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2000 년 155%에서 지난 2011 년 189%로 높아졌고 경기지역도 54%에서 79%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지방 6 개 광역시는 120%에서 85%까지 추락했다. 보고서의 계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거주할 경우 광역시에 거주하는 것보다 30 위권 대학 진학확률이 1.5%포인트 높아지고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광역시 학생들보다 4 년제 대학 진학확률이 10.7%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http://blog.naver.com/bulja200/30150877943>

김 연구위원은 "부모의 지위는 양육 방식과 멘토링의 질, 교육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면서 "어느 동네에 거주하느냐는 문제도 동료효과(Peer Effects)를 유발해 학생들의 성취 의욕과 학습시간 총량을 결정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월평균 사교육비가 10 만원 상승할 때, 수능 등급은 0.04 등급만큼 상승하고 주당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10 시간 늘어나면 수능 등급은 0.16 등급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명문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높은 사교육 의존도로 인해 사교육시장에 형성된 인프라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연구의 결론은 높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학업성취도를 만든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점점 증가하는 대학진학률에 연계된다는 것은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다. 높은 명문대학진학률과 증가하는 추세의 명문대학진학률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왜 이들의 명문대 진학률은 점점 증가하는 것일까? 이는 이들에 유리하게 교육정책이 변화하였고 변화하는 중이며, 자본을 많이 소유한 이들은 발 빠르게 정책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나 제도를 그 입맛에 맞추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닐까? 이러한 행위가 점점 심해짐으로 인해, 결국은 셋째 이유로 꼽은 결과의 평등의 교육을 가져 왔다. 이 때 말하는 결과의 평등이란, 공부를 상대적으로 못하는 부유층 아이는 변화한 입시정책에 빠르게 적응하여 대입에 성공하고, 공부를 상대적으로 잘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는 변화한 입시정책에 적응하지 못하여 대입에 실패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논리적 비약이라 생각하는가? 이미 이는 실현된 현실이다.

교육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평등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아래에서 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허용적 평등·보장적 평등·교육조건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에 그리고 교육결과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했듯 결과의 평등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복지의 시각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결과의 평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의 평등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의 교육조건이 평등해져도 교육결과에서 평등이 보장되지 않자, 교육결과 즉 학업성취를 평등하게 하게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것의 예가 수 년 전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던 고교평준화이다. 고교평준화는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였다. 결과의 평등을 이루려면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교사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수한 학생보다 열등한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역차별이 생긴다. 이를

담당하는 교육이 바로 공교육이다.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교육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교육 시스템은 공교육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해버렸고, 가르치는 수준도 많은 이들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가 되었다.



〈출처: http://blog.daum.net/sinmyoung/375269〉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이미 변화해버린 대입 대비는 공교육만으로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점점 대입 시험은 변하고 있고, 이는 누가 봐도 공정한 시험이 아닌 학생이 지닌 창의력, 잠재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창의성 노래를 부른지 어언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도구도 개발이 안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교육은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교육, 저 교육은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미 대입 전형에는 창의력,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등장하였다. 현재 한국에 도입된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제도인지 예를 통해 알아보자.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예체능 계열 특히 음악분야에서 역사상 최고 천재라 불리는 모차르트, 베토벤은 창의성 교육을 받고 천재가 되었을까? 그들은 아버지의 살인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고 성장하였다. 물론 창의성을 죽일 수도 있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창의성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많은 교육전문가, 교육정책가, 교육자, 학생들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지만, 비판해야 할 것은 교육 시스템이 아닌 입시정책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보든 천재든 일단 채찍질하여 기본적인 것은 다 알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개인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미국에서는 관련분야 종사자 소수만 할 수 있는 미적분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정규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기만 하면 가능하게 만들었으니 온 국민이 미적분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뭐라도 한 자리 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지지 않겠는가?

한국의 교육정책을 내놓는 정책가들은 창의성을 키우는 북유럽의 교육을 좋아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애를 쓴다. 그리고 우리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핀란드 교육을 언급하면서 교육은 북유럽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유럽의 교육제도가 뛰어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창의성 교육 때문이 아니라, 고아·미혼모·편부모 가정·가난한 사람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이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쏟아 붓는 복지제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부족한데다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위기까지 겹쳤을 때에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오기에, 모두에게 기회를 주자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교육정책이 지능이 낮아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도 그들의 성장가능성을 인정하고 최대한 이를 돕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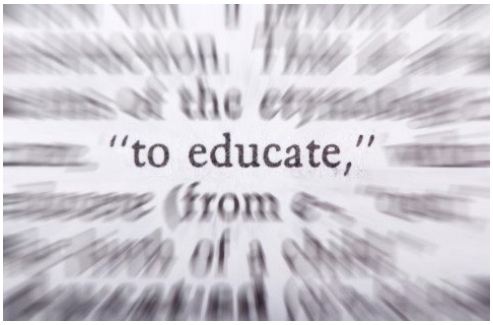
뛰어나다고 평가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이들은 이를 오해하고 왜곡하여, 한국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억지로 바꾸고 기득권층의 입맛에 맞추고 있다.



〈출처: http://svteach.wikispaces.com/Issues+in+Education〉

한국의 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많은 것을 배워버렸고, 학교는 뒷전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다 배웠겠거니 하여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는다. 학원을 다니지 못한 학생들만 피해보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학교의 모습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교육 의존에 의해 발생한 교육 격차를 해소할 해결책으로 김영철 KDI 연구위원은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EBS 수능강좌·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교육낙후지역 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책 확대를 촉구하였으며, 공교육 체계를 유린해 온 일상화된 선행학습에 대해 적절한 규제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기회균형선발·지역균형 선발·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과 같은 기회형평성 관련 전형을 확대해 대학교육의 기회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 "단순히 성적우수자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사람을 기른다는 철학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는 김 연구위원의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EBS 수능강좌 •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어려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대입 전형에서의 기회형평성 관련 전형 확대와 사회에 기여할 사람을 기른다는 철학을 기준에 따른 학생 선발에는 반대한다. 대입 전형에서의 기회형평성 관련 전형 확대는 말은 기회의 평등으로 보이지만 사실 결과의 평등이다. 또한 학업성취도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할 대입을 사회에 기여할 것 같다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는 너무 이른 전형으로 생각된다. 진정한 기회의 평등의 교육을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없이도 노력에 의해 명문대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능 난이도 정상화가 시급하다.



〈출처: http://www.whiteowlconspiracy.com/2012/09/education-and-democracy.html〉

교육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교육정책이라는 것도 많은 고민과 장기적인 혜안을 가지고서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국가 교육정책과 학제는 국민교육 제도의 근간이며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우리 나라 교육의 당면 과제는 정권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학제의 변경을 우선하기보다는, 수립된 기본교육 정책이나 학제를 어떻게 내실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가 보장되고 이루어질 때 세부적인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진로가 열릴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80 년대에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 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학업의 길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점점 사다리가 무너지고 21 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이라는 것에 의해 신분이 고착화되고 있다. 올바른 교육정책의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닐까? 교육정책을 내놓는 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쥔 자들이다. 부디 가까운 미래가 아닌 먼 미래를 바라본 교육을 실현해주기를 나와 많은 학생들은 원한다.

⑤ 나민아(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지난 7월 한국선진화포럼에선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 사회에도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토론회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신 교수님들께선 주로 '한국의 교육제도' 문제점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된 내용은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교육 환경을 축소시키는 반면 공교육의 활성화를 꾀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우리에겐 이미 익숙한 것입니다.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환경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밤 10시 이후에도 학원 문이 열려 있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하 단칸방에서 학원을 몰래 운영하기도 하는 등 학원들은 꼭꼭 숨어서 위험한 수업을 강행할 뿐 아니라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 저녁 늦게까지 그들을 학원에 넣어두는 부모님들의 압박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상황은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조차 무색할 정도로 밤 10시가 지나도 학원엔 훤하게 불이 켜져 있죠.



자식들이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들과 눈 코 뜰 새 없이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학생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왜, 자꾸만 수준 높은 대학,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만 찾는 것일까요? 서울의 S대 같은 경우는 단지 등록금이 싸서? 아닙니다. 주위에서 인정해 주는 대학을 나오면 자연스레 좋은 직장을 잡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경제적 능력이 확대 되어 신분이 상승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수능이 약 두 달여 남짓한 지금, 자녀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교육 열정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주변 자기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 수준 높은 대학에 필요한 면접, 논술 시험을 위해 고액의 과외를 하면서까지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생활비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 그 많은 돈을 지불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주위에서 들은 과외 이야기는 끝이 날 줄 몰랐습니다.

동생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서울대 재학중인 선배가 왔다면서 '그 선배가 위대해 보였다'라는 말을 수 십 번 하며 선배가 해 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 선배가 그러더랍니다. 서울에선 서울대에 다닌다는 조건 하나로만 과외비는 두 배로 올라간다는 것을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거액의 돈을 주고 과외를 시키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어느 날, 한 학생의 첫 과외시간, 어머니께 과외비는 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수업을 6번 진행한 후 우연히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더니 과외 학생 어머니로부터 6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생 선배는 한 달 과외비 100만 원을 두고 말을 한 것이었는데, 과외 학생 어머니께서는 수업 한 번에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신 거였죠. 그 때 과외 학생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내로라 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자연스레 미래도 걱정 없을 텐데 하루 1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여러분, 단지 몇 시간 진행되는 서울대 학생의 하루 수업비를 '100만 원쯤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족한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사교육비에 투자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한국 사회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소득층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분 상승은 그저 '그림의 떡'이겠네요? 하지만 아닙니다. 저희 20대 또래의 사례를 찾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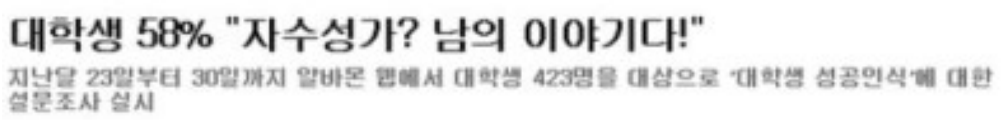
그 가까운 예로는 아이돌 엠블렉의 멤버인 이준을 들 수 있습니다. '도련님'이란 소리를 듣고 살았을 것 같은 외모와는 달리 힘겨웠던 그의 어렸을 적 가정사가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아이돌에 대해 '연예인 준비를 할 정도이였으면 집안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라 이준의 가정사 얘를 듣고 그가 새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용을 전공했던 이준은 무용복이 많이 필요했는데 여분의 옷을 단 한 벌이라도 사지 못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 안엔 바퀴벌레와 쥐들이 득실거렸고 칫솔모에 조차 바퀴벌레가 치약처럼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말이죠.

수업 외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었던 무용 동기들에 비해 실력이 현저히 낮았던 이준은 자신이 처한 그 때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모두 수학여행을 갔을 때 이준은 그돈 조차 아끼며 열심히 무용 연습에 몰두했고 혼자의 힘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당당히 입학했다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 노력한 결과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돈이 없다고 무시 받던 한 사람에서 이젠 세계인이 알아보는 가수가 된, 즉 신분 상승을 꾀한 것이 되겠죠.

40, 50대 분들이 자수성가하여 성공한 사례를 들었을 땐 '그 당시 시대였으니까 가능했지. 지금같이 스펙 중요한 시대에 자수성가는 불가능하다'라고 현실과 타협하려 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학생 58% "자수성가? 남의 이야기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알바몬 웹에서 대학생 423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성공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알바몬이 2011년 12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에게 '자수성가 가능성'에 대해 물어 본 결과 전체 423명 중 58%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고 32.6%는 '정말 특출한 소수의 몇 명만이 자수성가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나이와 비슷한 또래인 이준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건 간에 가정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대학교를 어디 다니든 간에 오로지 우리의 노력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요.

부모님 소득이 좋지 않네 하는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핑계일 뿐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 자신이 신분 상승을 이룩하지 못한 다는 것을 외부적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⑥ 민숙희(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영문학부)



넓은 캠퍼스, 자유로운 분위기. 누구나 꿈꾸는 대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학교가 부실대학으로 선정된다면?

부실대학이란?
정부는 작년 7 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등의 단계로 구조 개혁을 실시했는데요. 그리고 정부 자체 평가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을 선정하였습니다. 부실 대학 리스트에 오른 대학들은 학자금 대출 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되었고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대학 재정을 정부가 신뢰할 수 없으므로 학자금 대출을 비롯하여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국가장학금 수혜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인데요. 재정이 불안한 대학들은 정부에 대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것이고, 이 지원을 제약한다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는 큰 위험인 것입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나 연구에 참여를 못하거나 참여를 하더라도 상당부문 제약을 받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축소해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보통 대학 재정상태, 부채,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전부 고려해서 부실대학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학생 충원율(30%)과 취업률(20%)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에서도 '절대지표'인 취업률 50%, 재학생 충원율 9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100%에서 2 가지 이상 충족시키지 못한 곳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되고요.

단계별 구분	내용
1단계	재정지원 제한
2단계	대출 및 재정지원 제한
3단계	대출 및 재정지원 제한 및 컨설팅
4단계	부실대학 퇴출

그러나 이들 대학이 곧바로 부실 대학으로 지목돼 퇴출 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비슷한 개념을 꼽자면 교과부가 지정하는 '경영부실대학'이 그것이 되겠죠. 하지만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 경영 개선을 권고하고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도 이를 수용, 개선하지 못할 경우 학교 폐쇄 또는 자진 해산을 유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 부정비리가 발견된 2~3 개 대학은 퇴출이 되며, 시정 명령을 받은 나머지 대학 중에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본래의 재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학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부실대학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부실 대학이 선정 기준이 모든 대학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업률 100% 대학 광고들?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선정지표

(단위=%)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취업률	20	20
재학생 충원율	30	40
전임교원 확보율	5	5
학사관리	5	5
장학금 지급률	10	7.5
교육비 환원율	10	5
상환율	10	10
등록금 인상 수준	10	5
산학협력 수익률	-	2.5

※ 자료=교과부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취업률이 100%인 대학광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취업률이 100%인 대학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과부의 부실대학 발표 후 실제 근무하고 있지도 않은 근무지에 이름만 올리고 건강보험만 가입시키는 등 취업률을 허위 공시하여 4 개의 대학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총장이 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먼저 취업률을 보시면, 20%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모든 대학에 똑같이 적용시켜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한 예를 들어보면, 서울의 S 대의 경우 예체능계 전공자의 취업률 '저조' 인해 '리스트'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예체능계는 취업이 힘들고, 보통의 경우 일용직, 비정규직 등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S 대와 같이 예체능 특화가 된 학교나 인문학이 특화된 대학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대학별 특별한 사정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측정한 결과인 것이죠. 취업률이 낮으니 부실대학?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재작년 우수대학으로 평가 받았던 대학들(9 개교)의 20%가 작년에는 부실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던 학교들이 작년에는 B 급 부실대학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산정 결과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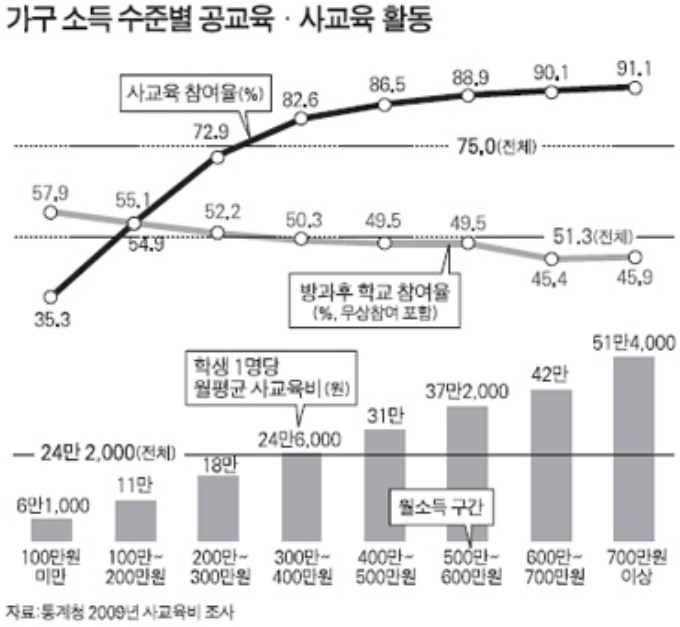
부실대학 선정 기준을 개혁, 확립하고 대학을 '취업 시켜주는 기관'이 아닌 본래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움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⑦ 송민영(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2012 년 9 월 9 일, 친구들과 현대 한국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의 신분제도가 형태는 비록 다를지라도 아직 현재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사농공상에 대한 차별, 즉 상업은 천하고 선비가 가장 고귀한 직업이라고 여겨지던 때와 현재 직업의 귀천에 대한 인식은 순서나 종류만 약간 바뀌었을 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비를 귀하게 여겼다면 현대 사회에선 '사'자로 끝나는 전문지식 기반 직종,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이 으뜸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경영 분야, 즉 돈을 많이 번 사업가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당연시 되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은 조선시대만 해도 선비의 시각에서 천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화여대 대학생들이 이 문제를 두고 나눈 토론에서는 경영, 즉 상업이 높이 평가되는 직업이 된 것을 문제시 삼는 건 아닙니다. 직업의 귀천, 돈의 많고 적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람들의 신분이 정해지고 고착화되어가는 현실이 저희의 문제제기 대상이었습니다.



67 차 월례토론회에서 성균관대 소속 교수님께서 벌떡 일어나 요즘 사회에 신분이라는 것이 어디 있을 말이냐고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저는 월례토론회에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왜인지 모를 갑갑함을 느꼈던 것이 해소된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교수님께서 표현해주시기 전에는 명확하게 무엇이 마음에 걸렸는지 몰랐지만 한 분의 문제제기 때문에 신분이라는 정의 자체가 암묵적으로 내려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 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를 바꿀 수는 없는가' 였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을 한 결과 '왜'에 대한 답은 과거로부터 나왔고, 이를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를 뿌리 채 바꿔버리고 구습을 타파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과거를 지우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몇 백 년에 걸쳐서 형성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해결방안이라는 점은 오히려 저희 토론자들을 낙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과거를 지우는 방법은 지금부터 지우개로 지워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의 마무리 부분을 쓰기에 다다른 현재는 이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한 때보다 미래입니다. 미래를 바꾸고 과거를 지우는 방법은 현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2년 9월 9일 이후 다섯 명의 이화여대생의 인식은 현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신분을 타파하려 노력하자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랬다면 좋았을 걸을 생각하는 대신 매 순간 미래를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한다면 언젠간 과거는 잊혀 지워지고 새로운 과거, 새로운 현재, 새로운 미래가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⑧ 유선미(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노력 해보셨나요? 해보셨다면 얼마나 해보셨나요? 죽을힘들 다해서?



예전보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이 어려워졌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들만이 계층 이동 즉, 신분상승을 합니다. 정말로 간절하다면 그만큼 노력을 할 것이고 그만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신분상승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성세대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꿈을 무참히 버리며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에 따라 국가 경쟁력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산다'의 개념이 정확히 어떠한 것이라 정의를 내리긴 어렵습니다. 아버지 세대에는 끼니에 대한 걱정으로 열심히 사셨고 지금까지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들의 주도권과 국가 경쟁력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성세대들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자신들의 목이 달아날 수 있으며 그것은 다른 말로 실업자가 된다는 소리이며 가족이 해체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스펙'이라는 것에 점점 목을 매게 되고 이러한 스펙은 계층 간의 집단을 양극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펙 위주의 경쟁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로가 경쟁을 하며 이기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한 예로 학교에서는 차별화 교육을 시키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상위 클래스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하위 클래스로 반을 나누어 차별화 교육을 시키며 험악한 분위기 고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차별화 교육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잘하는 집단은 더 잘하게 만들고. 하위의 집단은 점점 뒤쳐져 나중에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의 위치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간의 경쟁을 하다 보니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점점 혼자가 되고 많은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따같은 것들이 나오며 그 아이들이 커서 사이코패스나 성범죄 살인 등 사회의 악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성격의 차이, 성향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어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시스템. 신분상승의 길은 교육과 노동 기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교육과 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실리콘벨리에서 빌게이츠와 스티브잡스는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서서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사를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스템문제입니다. 한국에선 사업, 창업에 실패 하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잃고 한강을 찾아가기 일수지만 미국의 시스템은 그들을 그렇게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끊임없는 관찰과 지원, 협력으로 그들은 다시 일어서 최고의 기업으로 탄생시켰고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을 고조 시켰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부터 잘 사는 사람들에겐 모든 혜택을 퍼주고 못사는 서민들에겐 빼앗아가는 착취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부의 세습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에게 그것을 물려주어 우리에겐 기회조차 주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삼성 家'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의 세습에 삼성家 의 이병철 회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건희 회장을 삼성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측근들을 제거하고 후견인을 두어 후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겐 모두가 평등할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권리조차 부와 권력 앞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국가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고, 기회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는 노릇이여서 서민들만 죽어가죠.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이런 한국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노동정책도 젊은이의 일자리 알선에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회의 균등. 우리에게 얼마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까요? 우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민 입니다. 그 권리를 부유계층에서 남용하고 있지만 그런 남용을 막기 위해 정책을 개편해야 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체 혹은 사전인 조직에서도 감시의 눈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가 바늘 구멍보다 작지만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가 서로 'win-win'하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현재의 우리들에게 좋은 가회를 마련해 주며 우리는 그에 부응하여 선의의 경쟁으로 나뿐만이 아닌 서로가 함께 짊어지고 나갈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⑨ 윤보라(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다가오는 2012년 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판을 움직이는 다양한 이슈들 중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만한 이슈는 바로 '반값등록금'입니다.

그 뜨거운 감자,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임금대비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사실과, 등록금에 거품을 걷어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는 듯 보입니다. 특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더욱이 등록금 인하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요.



제가 다니는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의 2012년 2학기 등록금은 15주 수업에 약 36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국가장학금 제도와 함께 학교 수업은 16주에서 한 주 줄어든 15주 수업으로 줄어들었고, 등록금은 평년 수준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의 중복 수혜를 받아 반값 남짓의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었지만, 장학금 수혜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에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처럼 대학교 등록금은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의 마음에까지 커다란 짐으로 다가오게 되죠. 하지만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부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공인인증영어성적' 즉, 일정성적 이상의 토익 혹은 토플 점수를 인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는 자, 토익 점수를 들고와라

성신여자대학교 2012년부터 성적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에서 3등 안에 드는 성적을 얻음과 동시에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인증영어성적을 제시해야 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제도는 많은 학생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학교에서 공지한 공인인증영어 유효 성적 아래와 같습니다.

계열	구분 /승급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일반계	TOEIC	-	600	700	800
	TOEFL CBT	-	163	217	240
	TOEFL IBT	-	57	82	94
	TEPS	-	480	575	690
예체능계	TOEIC	-	400	500	600
	TOEFL CBT	-	97	120	163
	TOEFL IBT	-	-	-	57
	TEPS	-	345	403	480

많은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준비하는 토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2학년은 600점 이상을, 3학년은 700점 이상을, 4학년은 800점 이상을 받아오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교내 성적이 우수할지라도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후배는 학점 4.5만점에 4.5점을 받아 과 1등을 했지만, 토익 성적이 없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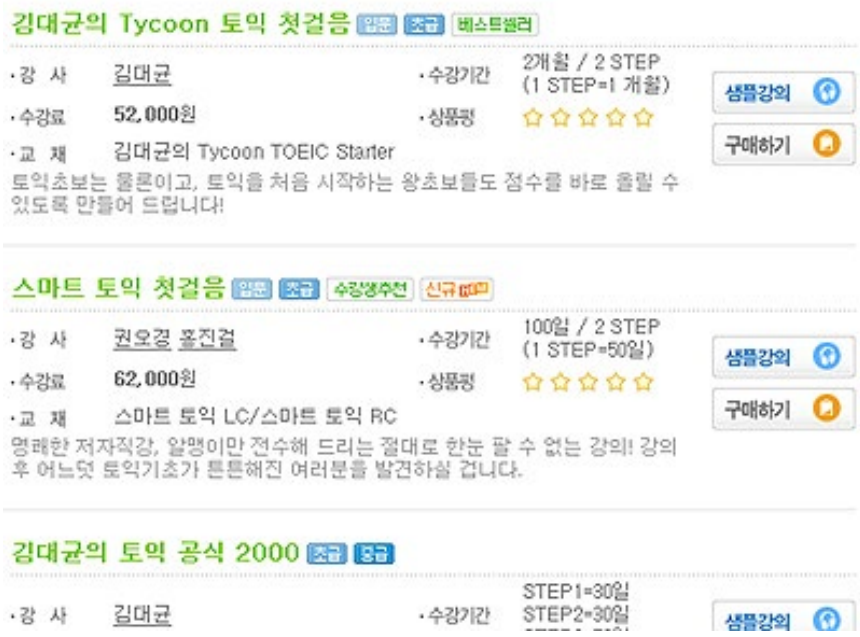
이유로 전액장학금 수혜에서 제외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학교에 여러 차례 문의 전화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영어 성적이 없으니 일부의 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달마다 42,000원을 내고 토익 시험에 응시해라?
대한민국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어학능력시험을 준비합니다. 교내에도 여러 가지 어학 관련 수업이 개설되어 있고, 어학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에는 기준 제한이 존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에 개설된 사설 토익 특강의 경우 수업료의 50%를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지만, 여기에는 모의 TOEIC 점수 150점 향상 혹은 출석률 80% 이상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또, 어학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장학금 제도의 경우 토익 성적이 800점 이상인 학생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토익 시험을 준비하기는 하겠지만, 토익에서 고득점을 얻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공지한 유효 토익 성적을 얻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익 공부를 따로 해야만 하죠.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설 학원을 다닌다거나 혹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독학을 하며 시험 공부를 하고, 토익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인터넷 강좌 수강비〉



〈현장 강좌 수강비(주 5 일)〉

종로에 위치한 YBM어학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장강의의 경우 가장 비싼 수업이 주 5일 수업에 42만원인 수업입니다. 유료 인터넷 동영상의 경우 5만원 부근의 수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무료 인터넷 강의도 있고, 비교적 혜택이 많은 교내 토익 수업도 있으며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어찌됐던 우리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토익 시험을 봐야 하므로,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는 토익 시험에 응시해야겠죠.

토익시험 응시료는 얼마냐고요? 2011년 대비 약 7.7%가 인상된 42,000원 입니다.
이제 성신여대 학생은 제 아무리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에서 1등을 했을지라도 학교에서 제시한 토익 성적을 넘지 못한다면 전액 장학금은 꿈도 꿀 수 없지요.

과거에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을지라도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장학금 수혜를 받음으로써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부를 하면서도 매달 42,000원이라는 돈을 추가적으로 더 내가며 토익 시험까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추가 접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46,200원으로 약 50,000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면 여러 차례 응시해야 하므로 그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 성공하겠다는 욕심을 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자신이 오랫동안 품어온 꿈을 이루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돈을 쥔 사람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부모세대의 계층을 뛰어 넘어 계층 이동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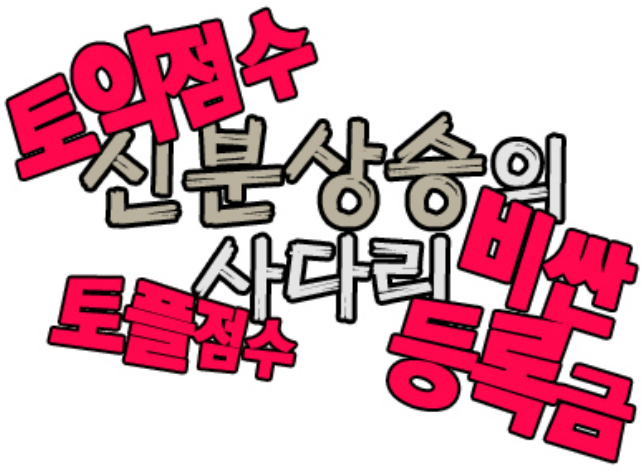
또한 사회는 학생들에게 성공의 가장 쉬운 방법은 공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제시하는 토익 성적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쓸모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높은 토익 성적을 보유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지요.

다만 아쉬운 것은 토익 점수가 학교 생활과 장학금 수혜에 있어 '하면 좋은' 추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린 상황 입니다. 전공공부를 열심히 해도 토익 성적이 없으면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니!

또한 자녀의 토익성적은 부모의 성적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지난 6월 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모소득이 100만 원 많으면 자녀의 토익점수가 21점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곧 영어 성적 역시 부모의 재산에 영향을 받으며, 영어와 부의 순환 대물림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어른들은 지나가는 말로 '커피 한 잔 사먹지 말고, 친구들이랑 외식 한 번 하지 말고 그 돈 아껴서 토익 시험 봐라!'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장학금이 간절한 학생들은 그렇게 비싼 커피를 자주 마시지도 않으며, 식사라곤 주로 2800원의 학생식당을 이용하거나, 어쩌다 한번 만 원 남짓의 외식을 할 뿐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4만 원이 넘는 토익 성적이 있어야만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며 동시에 또 하나의 짐을 얹어주는 소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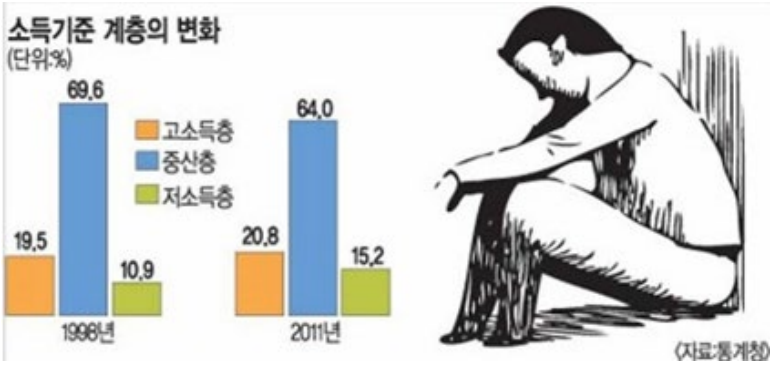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확대된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국가장학금이 확충 됨과 동시에 수업 일수는 줄어들고, 장학금 수혜의 방법은 까다로워지기만 합니다. 공부를 통해 계층 이동을 꿈꿔보지만 지금의 학교는 어쩐지 돈이 없으면 공부도 못하는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비싼 등록금과 유효 토익 성적 인증, 그리고 까다로운 장학금 수혜방법이라는 장애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⑩ 이철우(청주대학교 무역학과)

과거 시골에선 어느 집 자녀가 서울의 유명 법대, 의대에 들어갔다고 하면, 온 마을이 잔치를 벌이곤 했다. 법대에 들어갔다는 것은 곧 출세와 성공을 의미했다. 부모님으로선 소 팔고 땅 팔고 집 팔아 자식에게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통했다. 그래서 동네 잔치까지 벌인 것이다. 부모님 세대에서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나 역시 중산층 아니 상류층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지를 갖게 해주었다. 또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끌어온 핵심적 요인이 됐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교육기회가 더 확대된 오늘날 오히려 과거보다 계층상승의 기회는 적어지고 계층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이 과거보다 월등히 많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시장은 더욱 세분화되고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일반적으로 계층 간 이동의 통로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교육과 노동이 맡는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교육이 요즘 한국 사회에서 신분상승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점에 대해 의견을 써보려고 한다.

우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1980년대까지 빈농, 소농 출신들이 교육기회를 통해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신분상승 이동에 성공한 사례가 흔하게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대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였고 이는 곧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신분상승의 계기가 됐다. 하지만 1990년대 이래 대학 교육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승의 사다리로서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대학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이 학생들 본인들의 특성과 적성보단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선택하고 입학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양적으로는 세계에서 고등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가 되었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실속 없는 결실만 많아진 셈이다.

두 번째는 교육 체계가 지나치게 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립학교 비율이 너무 높아서 지불 능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신분상승의 유일한 기회 중 하나인 교육 역시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배경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가정 배경이 자녀 성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순서

1	영국
2	스코틀랜드
3	헝가리
4	독일
5	한국
6	슬로바키아
7	미국
23	일본
29	프랑스

미국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에릭 하누셰 교수팀이 TIMSS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0년 4월)

사교육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공교육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교육을 통해 상류층 아이들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비해 중산층, 하류층은 더욱더 기회를 얻기가 힘들어 지고 있고 결국 현재 교육이 신분상승의 기회를 줄이고 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 제도는 국제화 시대, 국제적인 분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협소하고, 포화된 국내 노동시장을 겨냥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 졸업 정원은 점점 증가하지만 국내에서 대학 졸업자가 일 할만한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상위대학 졸업생들이 차지하기 쉽다.

2009 대학졸업자 대기업 취업현황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제외)

대학	졸업자	취업대상자	대기업취업자	대기업취업률
서강대	1,683	1,353	698	51.6%
성균관대	3,770	2,995	1,447	48.3%
고려대	3,989	2,897	1,312	45.3%
한양대	3,279	2,549	1,061	41.6%
연세대	3,914	2,790	1,051	37.7%
한국외대	1,533	1,290	482	37.4%
인하대	3,388	2,807	987	35.2%
아주대	1,841	1,470	485	33.0%
한국항공대	890	714	222	31.1%
건국대	2,787	2,383	719	30.2%
중앙대	2,709	2,492	733	29.4%
경희대(국제)	2,599	2,172	595	27.4%
서울대	3,739	2,316	619	26.7%
홍익대	1,991	1,766	462	26.2%
경기대	2,485	2,309	600	26.0%
동국대	2,719	2,355	602	25.6%
서울시립대	1,509	1,288	314	24.4%
한양대(안산)	2,061	1,695	393	23.2%
경희대	2,530	2,200	470	21.4%
숙명여대	2,087	1,713	324	18.9%
국민대	2,659	2,472	466	18.9%
숭실대	2,361	2,045	382	18.7%
한국외대(용인)	1,338	1,110	204	18.4%
광운대	1,615	1,343	236	17.6%
이화여대	3,394	2,617	454	17.3%
중앙대(안성)	2,261	2,031	318	15.7%
단국대	2,209	1,992	302	15.2%
세종대	2,100	1,863	245	13.2%
서울여대	1,510	1,416	164	11.6%
인천대	1,279	1,151	115	10.0%
성신여대	1,985	1,827	170	9.3%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에 맞춘 대학 졸업정원의 축소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학교의 강제적인 폐교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단 대학 또는 개별대학의 개별학과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퇴출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으로 국민들은 교육을 복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이나 가족의 투자로 인식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높은 사적 교육비 지출로 나타난다. 정부의 역할은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점차 바꿔야 하는데, 교사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자율성과 전폭적인 신뢰를 부여하여, 개별 학교와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강화 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양극화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이 완결되어 가는 시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나 겪고 있는 현상이다. 위기를 통해 성장을 할 수 있듯이 지금의 위기는 한국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다.

⑪ 장민영(고려대학교 북한학과)

21 세기에 신분상승이 웬말이냐구요? 우리는 돈과 명예, 권력으로 나뉘어진 신분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은 신분으로 더 안정적이고 더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취업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한 강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인맥과 든든한 뒷배경이 제일인 나라라고. 말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후에 아나운서, 방송국, 홈쇼핑 쇼호스트까지 모두 지원을 해보았는데 결국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만 됐다고 말이죠.

물론 이 이야기를 '노력할 필요없다'라는 결론을 위해 꺼내신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분상승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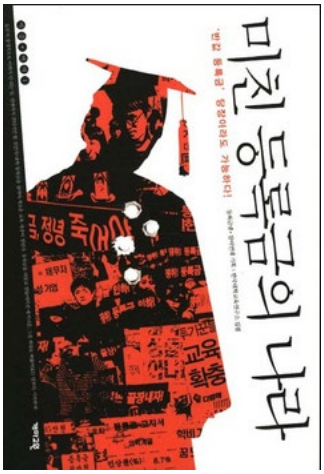
얼마 전 의학드라마 골든타임에서 함께 지내고 일하던 여의사 '황정음'이 알고보니 병원 이사장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위사람들의 대우와 시선이 달라지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분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권력과 돈에 의해 우리는 신분이 매겨지고 있었습니다.

구분	대학	평균 등록금		인하율
		'12	'11	
1	한국항공대학교	8588.9	8638.5	-0.57
2	연세대학교	8563	8692.3	-1.49
3	을지대학교	8539.2	9014.2	-5.27
4	이화여자대학교	8454.3	8685.8	-2.67
5	연세대학교(원주)	8446.4	8626.7	-2.09
6	한양대학교	8388.3	8585	-2.29
7	추계예술대학교	8386.9	9317.5	-9.99
8	한세대학교	8361.1	8913.8	-6.2
9	홍익대학교(세종)	8354.5	8487.5	-1.57
10	성균관대학교	8333	8508.2	-2.06
11	상명대학교(천안)	8316.1	8999.4	-7.59
12	한양대학교(ERICA)	8302.3	8461.3	-1.88
13	고려대학교	8286.5	8461.2	-2.06
14	한서대학교	8197.1	8681.9	-5.58
15	홍익대학교	8183.4	8311.1	-1.54
16	아주대학교	8172.2	8400.2	-2.71
17	명지대학교	8148.6	8578.1	-5.01
18	건국대학교	8148.5	8351.5	-2.43
19	경희대학교(국제)	8146.1	8396.7	-2.98
20	고려대학교(세종)	8132	8297.8	-2

〈대학 등록금 순위 및 인하율〉

우리 사회는 더 잘살기 위해, 신분상승을 위해 대학교라는 관문은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많은 대다수의 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댓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등록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며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볼 수 있는 등록금의 문제도 또한 그 이유입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학생과 정부 모두가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정부와 교과부가 등록금 인하를 적극 독려하였는데 2012 대학등록금 순위를 보면 전국 4 년제 대학들의 올해 평균등록금은 6,706,000 원이였고 국공립대학은 4,150,000 원 사립대는 7,373,000 원이였습니다.

인상을 할 대학들은 3% 이내로만 인상을 하라 그 이상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방침을 내리자 마자, 대학들의 꼼수는 2%대의 인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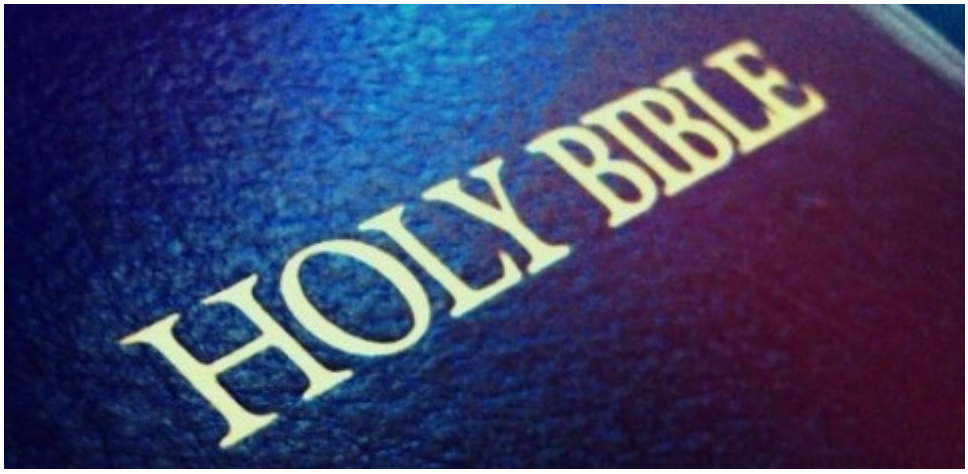
‘미친 등록금의 나라’ 라는 책에서는 우리나라 등록금이 얼마나 높은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사용되는지 그리고 장학금은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의 저자를 만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초 이 책의 독자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정도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되고 모두가 읽는 책이 되어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책을 이야기하게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과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고 질문에도 답해주셨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반값등록금과 더불어 복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국가장학금 제도와 대학자율화를 이야기하여 대학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뭔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돈문제가 왜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일까요?

큰 무리를 해서라도 대학을 가야 한다는 우리나라가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대학등록금이 1 위인 미국.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두가 대학을 갈까요? 대답은 No 입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대학등록금 문제 및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인식 개선 및 기술교육에 대한 캠페인과 의식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효과(Matthew effect)〉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68 년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킹 머튼교수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설명하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5 장 구절에 착안하여 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 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구절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하는 수단이 발목을 잡아 더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돈을 외치고 있는 학생들.....너무나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⑫ 정해경(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지난 9 월 14 일, 경기대학교에서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의 화두는 바로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한국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었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분이라고 말을 쓰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 상승'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인 양극화와 그로 인한 계층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이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농업, 영세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녀가 부모와 달리 판사, 검사, 의사 등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한 때 자주 쓰인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도 이러한 현상을 두고 생겨난 말이지요. 결국 이렇게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위한 통로를 제시해 주는 건 교육뿐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육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교사 등 소위 **사(師)**자로 끝나는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은 고액의 과외, 학원 등 사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액의 과외나 학원 등을 다닐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얻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위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양극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눈에 보더라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교육차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양·질적인 차이가 벌어지면서 소위 소득이 낮은 계층에 속하는 자녀의 학부모들은 빚을 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교육 확대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1980 년 7 월, 당시 정부는 교육정상화와 과열된 과외 붐을 해소하기 위해 과외 금지조치를 시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과 과외강사들의 교육권 요구로

인해 결국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학입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백 만 원이 넘는 족집게 과외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사교육과 관련된 많은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여주기 식' 정책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데요.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EBS 의 경우, 되려 EBS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학원과 과외가 생겨나면서 사교육비만 추가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무너뜨린 교육의 양극화는 해소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일까요?

사교육 관련 정책 변화

1968년	7월15일	중학교 무시험 입학정책
1973년	2월28일	고교평준화 정책
1980년	7월30일	과외 전면 금지 및 보충수업 폐지
1984년	4월10일	고3 겨울방학 중 사설 외국어 학원 수강 허용
1989년	6월16일	초·중·고생 일정 기간 학원수강 허용
1989년	6월22일	대학생의 초·중학생 과외교습 허용
1991년	7월22일	초·중·고생 여름방학 기간 학원수강 허용
1995년	8월4일	초·중·고생 학기 중 학원수강 허용
1997년	8월26일	교육방송 실시
2000년	4월27일	과외 전면 허용
2004년	2월17일	EBS수능방송, 방과후학교 실시
2008년	1월22일	수능등급제 폐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2009년	6월3일	외고입시 지필고사 폐지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

경기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 양극화에 대해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 결국은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경쟁의식이 강하고, 전문대와 4 년제에 대한 처우가 확연히 틀린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회 분위기 개선입니다. 더불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보여 지는데요. 이제 곧 탄생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부디 많은 국민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해 주길 희망해봅니다.!!

⑬ 황재인(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과거사회에는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천민은 천민, 양반은 양반. 그 정해진 차이는 노력으로써 좁혀질 수 있는게 아니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이라는 것은 이미 그 사회에 깊게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당연시 여겨졌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고 여겨졌으니 말이다.

현대사회에는 조금 다르다. 현대사회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지 않는다. 어떤 것을 원하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이다. 개인은 국가에서 제한하지 않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취할 자유가 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성취해낸 결과는 경쟁이 존재할 뿐 누구도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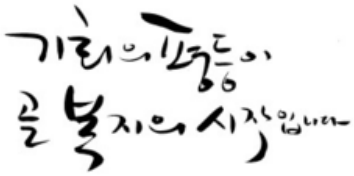
지금 현재 21 세기가 아닌 20 세기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았다. 힘든 환경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엔 성공을 했던 사람들 말이다. 남들에게 존경받을만한 인물이 되었고 지금 현재 21 세기는 개천에서 난 용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21 세기에는 그런 개천에서 난 용을 키워내기는 힘들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나 또한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과거와는 다른 현대 사회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신분이란 것이 존재한다고.

학교에서 학우들과 이루어진 첫 토론은 과연 토론이란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의견이 분명했다. 대부분은 현대사회에 그 보이지 않는 신분이라는 것을 상승하기 위한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또는 존재하지만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의견이 분명했다. 그 안에 총 네 명의 토론자들 각각의 의견도 분명해서 더욱 재밌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부정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지만 들어보면 그 논리는 확실하다. 자신의 생각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논리가 있는 주장들이었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회는 이미 계급이란 것이 확실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승하려는 노력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생각해보면 참 섬뜩한 이야기였다.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현대 사회에서 노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확실한 신분이 존재하다니. 하지만 그 신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참 섬뜩했다. 하지만 다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는 사그라들지 않았나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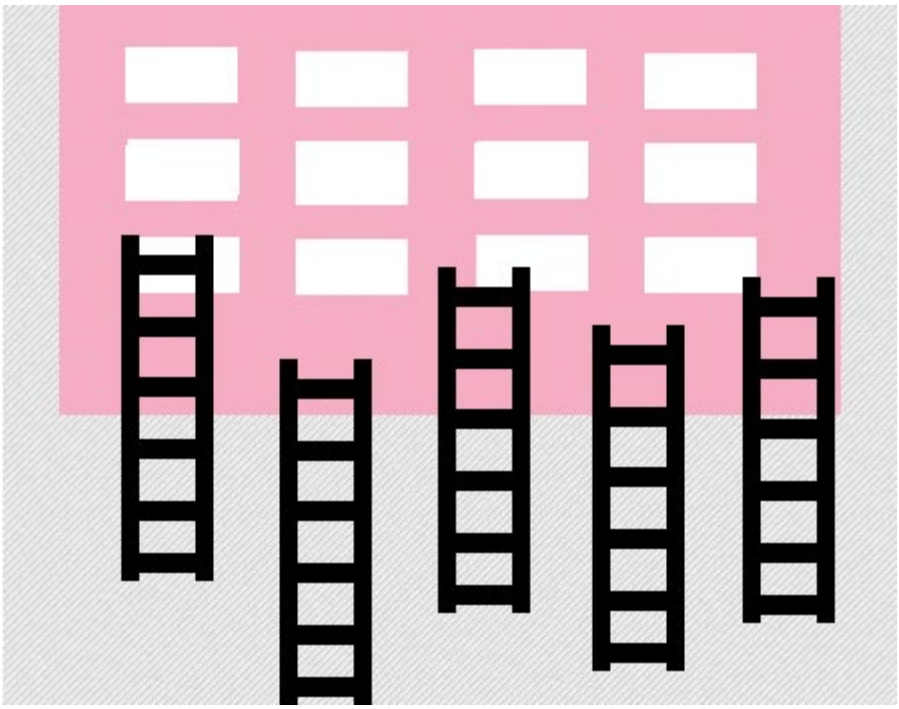
‘대한 민국 개천에서는 용이 난다’ 라는 말은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견인차의 역할을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개천에서 난 용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이며 또 다시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애쓰는 개인의 노력들이 많이 있다. 또 과거 개발시대 때와는 다르게 차원이 다른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희망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었다.

토론의 주제는 우리가 한번 논할 법한 주제이면서도 생각하면 딜레마에 빠지게끔 하는 주제였다. ‘현대 사회가 퇴보하는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게끔 하는 질문이었지만, 아니다. 현대 사회의 양극화 현상 등은 확실히 심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의 복지 보장, 의무 교육화와 무료 급식 등을 통한 기회의 평등 보장 등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노력들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 조금씩 해결의 길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신분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하는 것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하는 것은 조금은 현실을 더욱 어둡게 바라보려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⑭ 채　련(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우리나라의 ‘신분상승의 사다리’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신분’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등한민주주의 사회에 신분이란 말이 웬말이냐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표면적인 신분은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격차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타나는 차이가 결국 알게 모르게 신분처럼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스터디모임을 하면서 신분이라는 것을 재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썩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장인이나 지식인들에게서 느껴지는 숭고함이 더욱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사회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다리는경제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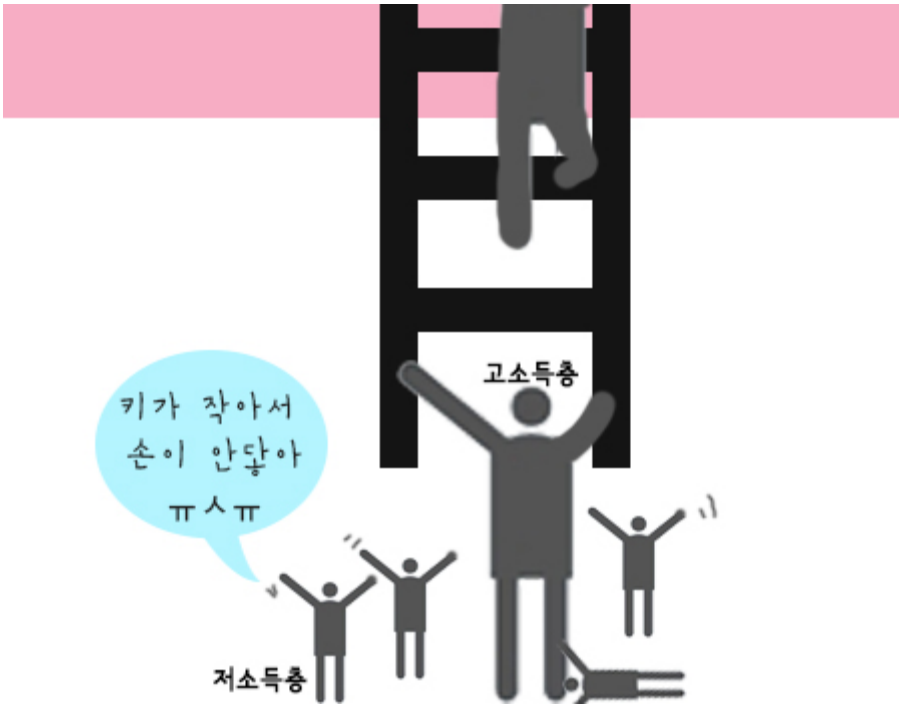


사다리는 존재한다. 그리고 많아졌다.

먼저,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은 ‘그렇다’ 입니다. 타고나는 신분이 사라진 뒤부터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신분이 이동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뛰어난 재능과 포부가 있다면 그 누구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방법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해졌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분상승의 기회는 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평등함을 호소하게 되었을까요?

1 사다리는 존재한다. 그러나 키가 작다.



: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는 놓아졌습니다. 누구나 능력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고, 낮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대로 올라가기 위해 이미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리 유지를 위해 사다리를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서 경쟁이 과열되었고, 과열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예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여부는 학벌로 경쟁된다는 신념 하에 그 어떤 나라보다 입시경쟁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입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사교육비를 많이 쏟을 수 있는 상위 계층입니다. 저와 스터디하는 친구들은 물론 대부분의 서울대생은 과외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과외를 받는 학생들에게물어보면 대부분이 사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부담이 되어도 사교육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다리는 있지만, 키가 작기 때문에 사다리로 뻗는 손이 짧아 닿기 어렵고, 올라가기에도힘이 드는 것입니다.

2 사다리는 존재한다. 그러나 옥상은 좁다.

"옥상 확장 해주세요!"



: 다음 문제는 사다리는 존재하지만 막상 올라가보면 자리가 좁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웅다웅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빚이 몇 천씩 쌓여도 일단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고지에 도착해서 고개를 들어보니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업의 문제입니다. 고용시장의 불안은 심화되어 일자리 수의 부족은 물론 비정규직과 같은 질 낮은 직업만이 늘어나고 있고 조기 정년퇴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사다리를 오르던 청년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고용시장의 문제해결입니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느낄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질이 좋은 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일자리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닌, 그 질을 높이는데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력한 사회구성원이 불안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해줘야 합니다.

3 학벌은 지름길이지만 그 길만이답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로프



: 저와 친구들은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있는가?” 에 “yes” 그리고 “그 사다리가 학벌이 될 수 있는가?”에 “yes”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아직 보잘 것 없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주위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만이 답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게다가 옛날보다 높아진 학력수준에 너도나도 대학졸업장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이 그 중요성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학벌만이 경쟁력이던 시대는 가고 개인 고유의 능력이 중요해지는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스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개인의 관심과 능력에 상관없이 보여주기 위주의 활동이 많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쓸데없는 경쟁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제는진정한 고유의 갈고 닦은 능력과 관심, 노력이 담는 스펙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불안감과 경쟁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성공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입니다. 처음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신분이란 돈으로 판단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돈을 얼마 버느냐에 따라 직업의 귀천을 다루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은 고학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에 교육 또한 과도하게 과열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러한 직업과 성공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의 뜻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펼쳐 나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틀에 박힌 교육 속에 잠재되어 있던 자신만의 역량을 펼쳐야 합니다. 즉 바로 이것이 사다리가 아닌 ‘개인로프’입니다. 개인로프는 혼자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선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의 적성에 맞고 또 원하던 길이라면 그 어떤 사다리 부럽지 않게 행복한 길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개인의 역량발휘를 위해서는 교육이 아닌 기술을 인정해주는 사회의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창성과 창의성을 운운하지만 아직도 그 큰 틀은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그로 인한 성공을 인정해주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9 월 13 일 목요일,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학우들이 모여 선진화 연구모임을 가졌습니다. 공대 학생의 시각에서 사회 이슈를 바라보고 고찰해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에도 존재하는가?』를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의 주제로 삼아, 우리나라가 지니는 특성과 한계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김화랑: 안녕하십니까?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 사회를 맡게 된 김화랑입니다. 이번 연구모임의 주제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에도 존재하는가?'입니다. '신분상승의 사다리'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1 세기 들어서도 '신분상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신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고 그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사회 구조적인 측면과 우리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에 시작하기 앞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신분'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한국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라: 우리나라는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신분'에 해당하는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소득 간 격차로 인한 많은 불평등에 대한 소식이나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씁쓸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대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바로 직전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더욱 민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과 20~30 년 전만 하더라도 신분상승이라는 말은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로 통용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물론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높은 자리에 올라선다는 의미이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계층이 고착화돼가는 상황에서 공부만으로는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힘든 사회, 즉 '신분상승의 사다리'라는 것은 없어져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성해: 저는 '신분'이라는 단어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계급이다, 계층이다 라는 말을 사용한다지만 신분은 더욱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계급으로 올라설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분상승이라는 단어는 권력이나 재력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현 시대는 인재풀이 과거에 비해 넓어진 상태에서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기득권층은 당연히 이러한 자신들의 지위를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법이나 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것이 올라가기 힘들어졌다뿐이지

노력을 해서 못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이라는 단어가 맘에 들지는 않지만 ‘신분상승의 사다리’라는 것은 아직 한국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서: 김성해 님께서 ‘신분’이라는 단어에 너무 치중하신 것 같은데, 단어의 실제 뜻보다는 어느 정도 비유해서 토론을 진행해야 할 듯 싶네요. 부족한 자원과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가 아닐까요? 물론,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고 운동이라든가 미술, 음악, 연기 등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혹자가 말하듯 공부가 아닌 분야는 1%가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지만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비율은 더 높으니까요.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 공부라는 것은 훨씬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문, 문화, 사회, 역사, 공학, 자연과학 등 많은 분야로 손을 뻗치고 있고, 위에서 열거한 체육, 음악, 미술 등에서도 학문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최고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부와 명예라는 것이 인생에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통용되는 ‘신분’이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부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틀을 깨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상: 하지만 대한민국 시스템이 점점 신분상승을 하기가 힘들게 변하는 것은 사실인 것같습니다. 어느 사회이든 기득권은 자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비단 21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확실히 깨달을 수 있죠. 권력자들은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자신의 권력과 부를 내려놓고 싶지 않아 합니다.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공학, 자연과학이나 인문학과 같은 학문적인 분야로는 성공하기 힘들고 법조계, 의료계로 국가의 수재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로스쿨, 의치전 등이 법대와 의대를 대신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정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부를 붙들 수 있는 현실이 되어가는 마당에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공부밖에 없었지만 점점 이마저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마저 평등에서 벗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신분상승이라는 것은 곧 옛말이 되어버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우정: 저는 먼저 이 토론에서 신분과 신분상승을 다음과 같이 사용했으면 합니다. 신분은 부, 또는 권력을 지니는 기득권층과 중산층, 그리고 서민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구분 짓는 것이고, 신분상승이라는 것은 그러한 계층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언제나 현실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주제도 이상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나 명예, 권력이라는 것을 잡기위한 것이 신분상승이라고 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각자 가치관에 따라 성공이라는 것을 다르게 정의하곤 하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이 부, 명예, 권력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랑: 네, 토론 시작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노우정 님께서 좋은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도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로 잘 살게 된 경우,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통틀어 신분상승을 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보: 먼저 많은 사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신분과 신분상승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였고, 또 기득권은 자신의 권리를 놓고 싶지 않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구조는 일반인보다는 법이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계층에 의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낳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 기회의 평등은 무조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면 참 좋겠지만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인간이 모두 평등하게 된지는 채 200 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근우: 우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체계라든지 입시정책, 그리고 전문대학원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무릇 한 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은 방향이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고 그 영향이 심원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가지고 백 년 앞을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조차 정치의 한 일부분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의 평등이 갈수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 시대에서 점점 퇴보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우제: 맞습니다. 입시정책만 하더라도 한 사람의 모든 역량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객관성있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인 수능은 점점 쉬워지고, 다방면의 재능을 본다고 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나 입시사정관제는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시비중이 높아지면서 바뀌는 입시정책에 빨리 적응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 집의 자녀들이 되고 있다는 것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수시 비중이 이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는 취지로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게 전문대학원을 신설함으로써 결국 법조계나 의료계를 가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 준비 후 대학 학부과정을 거쳐 또 전문대학원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전문대학원까지 마쳐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돈이 많은 집안만 가능한 세상이 온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기회의 평등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적 평등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경: 조근우 님과 장우제 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기득권이 내세우는 정책에 대해 심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구조적으로 돈이라는 것 때문에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신분을 자신의 노력에 의해 바꿀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신분상승이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이르러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화랑: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을 들어보니 모두들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해당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으나 현재는 그것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대학생으로서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인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에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솔직한 토론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 월 23 일, 서울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의 새 학기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첫 주제는 바로 한국선진화포럼의 67 차 월례토론회 주제인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사회에도 존재하는가'였습니다. 전공도 다양하고 학년도 각기 다른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채련 : 오늘은 미리 공지한 대로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사회에도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 해보자. 토론회영상과 자료를 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이나 직장을 통해 신분을 상승하려는 경쟁이 과열된 것 같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걸까?

김병호 : 나는 사실 '신분'이라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에 신분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니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그것이 돈과 관련 있다는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정진호 : 글쎄, 우리 사이에서는 신분의 기준을 얘기할 때 돈보다 학벌을 말하는 게 더 와 닿을 것 같아. 사실 우린 서울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돈이 신분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를 내포하는 면도 있지. 단적인 예로, 인간문화재인 장인과 로또당첨자 중에 사람들은 장인에게 더욱 가치를 주지 않을까? 물론, 부러워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된 벼락부자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존경과 우러러보는 마음은 장인에게 향할 거라 믿어. 그리고 그게 진정한 신분이 아닐까?

이어진 :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우라면 요새 사람들은 경제력 있는 사람을 더욱 신분이 높다고 여길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신분이 높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초점에 맞을 것 같다.

강솔 : 응. 나는 먼저 한국사회에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하느냐? 에 대한 질문에는 'yes'라고 생각해. 과거에는 절대적인 신분을 타고났지만, 어찌 되었든지 현대 사회는 노력이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때로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개인의 신분은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어.

정진호 : 맞아, 그리고 옛날에는 그 길이 공부나 무역처럼 특정한 몇 가지 좁은 길이었는데 세상이 다원화되면서 그 신분상승의 사다리도 많아지고 있어. 자료를 보면 학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학력도 신분상승의 길인 건 확실해. 하지만 학력만이 변수는 아니라는 거야.

김민아 :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학력이 적지 않게 작용하는 것은 확실해 보여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것이 있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채련 : 나는 그런 사회풍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무조건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너도나도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입시 경쟁과 학력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어. 입시 때는 입시할 때 나름대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데, 대학에 와서는 대학끼리도 서열을 만들어서 경쟁을 극화하고있어.

이어진 : 나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사실 이제는 고학력자가 만연해서 더 이상 대학 학력만으로는 큰 경쟁력이 될 수 없어졌어. 또 우리의 학력을 보상해 줄만한 좋은 직장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일자리 수의 문제도 있지만,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취직하고 싶어할 리가 없잖아.

김병호 : 악순환은 그렇게 좁은 옥상에 비집고 들어가려다보니, 경쟁이 더 과열되는 것도 있죠. 결국 일자리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적절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옥상을 넓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어진 :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사다리는 존재하지만, 탈 수 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교육과 개인의 역량을 기르는 데는 경제력 또한 밑받침 돼야 하는 게 사실이잖아. 특히나 요즘 세상처럼 사교육이 필수가 되어버린 세상에는 결국 고소득층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거야.

김민아 : 맞아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과외를 하고 있는데 그 만큼 사교육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저소득층 아이들은 받기에 부담스러울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요새는 사교육이 워낙 교육의 중심이 되다 보니, 공교육이 소홀해지는 면도 있으니까요.

강솔 :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평등한 사다리를 내려주고 싶다면 교육에서부터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출발은 공교육의 질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

채련 : 그리고 나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부와 학력만이 신분상승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새로운 교육 양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모두가 다 다른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국영수사과만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말로는 창의력과 독창성이 주목을 받는 사회라고 하지만 교육부터가 획일화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인재가 나올 수 있겠어. 특화된 중 고등학교의 양성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해

김병호 : 사람들이 요새 '스펙'쌓기에 열중하는데 어쩌면 그런 것도 학력경쟁 위에 생긴 또 하나의 심화된 경쟁으로 느껴져요. 관심 없는 활동을 단지 자기소개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해 해야 하기도 하잖아. 그 시간을 조금 더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찾고 계발하도록 하면 좋을 텐데요.

정진호 : 다원화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원화된 사회구성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원화된 구성원을 만드려면 우리나라는 먼저 '고학력-대기업-성공'이라는 인식을 깨뜨릴 필요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깨워낼 수 있는 인재개발프로그램과 그러한 인재를 인정해주는 사회적 풍토가 필요할 것 같아.

강솔 : 나는 지금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떠올랐는데, 요새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잖아.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고 있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또 한번 희망을 느끼는 게 사람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싸이처럼 개성있고 자신의 길을 간 사람이 인정받고 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채련 :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존재한다, 그러나 사다리가 모두가 평등하게 탈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구요. 또 사다리를 올라갔을 때 존재하는 자리, 즉 일자리의 폭이 넓어지고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2 학기가 시작하고 각종 행사가 끝난 뒤, 9 월 10 일 월요일 다양한 과가 모여 대학생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선진화 연구모임 1 회 주제는『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에도 존재하는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한계와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권력층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Korea University
1905
Sinology





장민영(북한 3) :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10 학번 장민영입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은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에도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분상승이라는 개념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너무 늦은 이야기일 수도 가장 와 닿는 이야기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과 우리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화(사회 3) : 신분상승이라는 말은 계층을 유지하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공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갈수록 이변을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상대적 평등 없는 교육 안에서는 신분상승은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이네요. 그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도율(물리치료 3) : 신분상승이라는 말을 이렇게 실제로 토론주제로 사용하게 된 것이 신기하다. 그저 은어로 사용되는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시, 행시 등을 본다면 신분상등이 이루어진다고들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네요. 솔직히 신분상승을 말한다면 돈이나 명예 그게 권력이 되는 것인데 말이에요.

강신욱(중국 2) : 주로 높으신 분들이 우리사회의 구조를 만드는 사회가 되어 있으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신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대에 와서까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기들은 높은 신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신분상승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김도율(물리치료 3) : 맞습니다. 현 시대는 돈이나 권력 등힘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커서 법도 바꾸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의 지위나 명예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 더욱더 심해지고…….



장민영(북한 3) : 맞습니다. 게다가 대학교육이 신분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고착화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학이 모든 성공의 척도는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이를 따르다 보니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더욱이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전공을 살려 직업을 가지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전문적인 그 분야를 본다면 석사, 혹은 박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곳이 많거든요.

조용민(고고미술 4) : 요즘 대학생들이 대학을 오는 이유는 순수한 교육목적으로 오는 것 보다는 좀 더 좋은데 취직하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오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는 그런 것 같아요. 전체 고등학생의 83%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건 이제 몇몇의 개인적이고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싼 것도 사실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문제도 쉽게 풀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환훈(사회 2) :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신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는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차이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저도 역시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옛말이 됐으니까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을 택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 같이 힘들게 가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는 도정일 씨가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성공에 대한 선망과 실패에 대한 위협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한 것 같아요.



조용민(고고미술 4) : 우리나라가 1894 년에 봉건적인 신분제가 사라졌지만 지금은 돈으로 계층을 나누는 경향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어요. 또한 노동자와 CEO 아니면 학생과 총창 등 이런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극히 수직적인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비록 우리사회는 출신성분으로 노예, 양반을 나누지는 않지만 돈과 우리사회의 환경이 계급을 나누는 것 같네요. 예전에야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돈 없으면 교육받기도 힘들고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 이런 말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되요.

그래서 요즘은 흔히 말하는 신분상승이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정환훈(사회 2) : 현 보수와 진보에서 권력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네요.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 보수진영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말로만 바꾼다 하지만 결국 법안을 내지 않거나 행정하는것을 보면 공익을 위한 법안인지 의심스러운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말하자면 효율과 효과를 구분해서 보면 효율은 같은 일을 적은 투입에 큰 창출을 노리는 걸 말하고 다니는 효과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건데 효율성만 추구하는 현 보수진영은 방향을 잘못 잡고 가서 가야 할 방향에서 반대방향으로 더 효율적으로 가는 상황으로 보여요.

장민영(북한 3) : 네. 지금 현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정권과 보수 진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깊숙이 본다면 다들 공익을 추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 않을까요? 객관적인 증거도 미흡하고 넓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진성민(북한 4)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의 축적과 자본경쟁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조상의 신분상승이라는데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부와 권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 수직적 신분상승이 이루어지는 '신 계급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면서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상의 신분상승은 사회구조와 사회 안전망 밖의 국민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소외시키는 등 그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물질만능'으로 치닫는 현재의 사회풍토를 바꾸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기업과 재벌들의 부의 독과점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의 건전한 경쟁구조와 안전망 확충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유하나(신소재공학 4) : 신분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신분을 두고 차별화하고 직업 또한 천하고 귀한 것을 나누게 됨으로써 그 존재가치에 대한 본질적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는 청소부 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그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누가 타인의 인생에 대해 감화 감동받을 순 있을지 몰라도 신분상승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삶의 위대함을 평하게 되는 사회가 아쉬워요.

안기원(중국 3) : 노력이 있으면 신분상승이야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막아서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로비와 혈연 지연 이런 것도 존재하고 크지만 우리처럼 노력하는 사람들만으로도 경쟁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서성훈(중국 1) : 맞아요, 신분상승이라는 말이 신분이 존재한다고 해서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신분상승이라는 말이니까요!

박은혜(사회 3) : 신분상승이라는게 로또당첨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닌 이상, 우리사회에서의 신분상승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교육, 인맥 등만 봐도 이미 출발점이 너무나도 다르니까요! 물론 엄청 뛰어난 몇몇 사람들은 가능하겠지요. 맨 밑에서 저 위로. 미디어에서는 너희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이데올로기를 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도 개뿔이라고 생각해요. 암튼 그럼에도 나 역시 국회 인턴을 해 봤는데 그게 김을동이 추천서를 써 줘서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인맥이잖아요. 비판은 하면서도 나 역시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렇게 했다는 게 함정 같아요. 진짜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없는 사람들은 살기 정말 힘든게 이 세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손주웅(수학 4) : 기득권 층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있고 그게 당연시 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은연중에 자신들의 것을 지키려는게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버린 것이구요. 아래 사람들이라고 일컫어 지는 사람은 올라가는건데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득권층은 신분상승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상우(물리 4) : 그래도 우리는 자유경쟁체제의 시장 경제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이잖아요. 노력하는 만큼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게 있고 그에 대한 댓가도 있을거라고 봐요. 물론 소수지만 우리는 이상을 생각하고 있어야 노력도 있는게 아닐까요?

손주웅(수학 4) : 만약 소득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세금을 두 배로 내서 풍족한 복지를 해보자는 예를 든다면 그 법을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주체가 되어버리니까 힘들다고 보는 것이에요. 보통 지금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부도 가지고 있으니까 위의 사람들은 군중을 바보로 두고 싶어한다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제를 하려고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음모론이 되어 버리나요?



장민영(북한 3) : 네.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스스로 경험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들 신분상승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토론이 찬반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어요. 구조적인 문제와 생각해 오던 것들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달 선진화 연구모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③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강소라 : 안녕하세요. 오늘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렸듯이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에도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도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대학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친구들이 좋은 대학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희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인 인정과 신분상승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김가영 : 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이야기할 때 대학 이야기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자원의 특징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땅을 파서 얻어낸 천연자원을 수출해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적 자원이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이 곧바로 신분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신분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신분상승 기회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은 :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대학진학만이 반드시 좋은 직장을 얻고 신분 상승을 하는 사다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는 대학진학률이 낮았기 때문에 비교적 대학에 진학하면 좋은 직장을 구해 성공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에 반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너도나도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신분상승의 기회는 훨씬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가 넘어갑니다.

평균수명이 80 세가 넘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내주지 못하는 노년인구의 증가로 노동시장의 공급자인 청년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신분상승이 가능한 일자리들은 정해져 있는 반면, 새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이 신분상승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지금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 저 또한 유지은 씨와 마찬가지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사교육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부모들의 부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부를 부모가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질 높은 삶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김지연 : 저는 처음 말씀하셨던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속도의 문제 같습니다. 부를 지닌 사람들은 빠르게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다리를 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선 : 김지연 씨, 그러면 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지연 : 사회구조가 존재하기에 신분상승의 사다리도 존재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제가 말하는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시간을 남들보다 더 들여서 분명 오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해외유학의 경우 집안이 받쳐주면 금방 다녀올 수 있지만, 가난한 집안 환경을 가진 학생의 경우 다른 루트를 통해 해외유학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소라 : 김지연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 친구는 전문대를 졸업하여 현재 직장생활 2 년차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명 4 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 입사하였습니다. 어이 없게도 신입사원보다 직장 2 년차인 제 친구의 연봉은 500 만원이나 낮았습니다.

친구는 제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보며 경력보다도 대학이 우선되는 이 사회에서는 대학과 신분상승은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대우받고 신분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가영 : 신분 상승의 사다리의 첫 단추로 불리는 대입을 위해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이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발전을 위한 수단입니다. 인재가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까지의 국가 정책의 기조나 정치권의 움직임은 단순히 포퓰리즘에 얽매여, 표를 하나 더 얻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 마련에만 급급했습니다. 당장 권력을 잡는 것만 염두에 두며 썩은 고름을 짜낼 생각은 하지 않고 주위에 흘러내린 피고름만 닦아보겠다는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정책들로는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보람 : 그렇습니다. 최상위의 신분은 그 아래로의 신분으로는 하락이 되질 않습니다. 최하위의 신분층도 정말 그 신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러한 현상은 계속돼 왔습니다. 저는 정말 신분상승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가영 : 공교육의 부활을 위해 사교육을 줄일 목적이라면 밤 10 시 이후에 영업하는 학원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 자체를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 행정적인 일 때문에 정작 본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공무원이라는 미명 하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좀 더 좋은 교육법을 위해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신분상승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국민은 그 불만이 점점 통제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이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지면 처음엔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이는 점차 분노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안효정 : 좋은 삶, 성공적인 삶이란 것이 좁다랗게 정해져 있는 이런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인식이 대학 진학을 평범한 인생에 있어 하나의 필수 요소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본질이 다른 목적에서의 대학 진학자들을 무수히 낳고 있는 대학진학 유행은 고급 인력 공급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이 과잉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만을 대우하고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회 인식과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제도가 구조적으로 마련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게 하는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영 : 안효정 씨의 의견을 보충하겠습니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 대한 생각으로 핀란드도 한국 못지 않게 대학진학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교육이 최상수준이고 노력여하에 따라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대학진학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핀란드는 학생들에게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탐구, 학생의 역량, 사회에서 자신이 바라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주지 않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목적이 없는 주입식 교육은 학생들을 압박할 뿐입니다.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신분상승의 사다리도 막연하게 존재하리라는 일종의 의식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모두들 대학에 진학하지만 핀란드는 학생자신이 바람으로 만들어낸 입학인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가 만들어낸 입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효정 : 김지영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맹목적인 대학진학이 유행하게 된 데에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비교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풍토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방향이란 것이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이상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질 것이고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지선 : 물론 신분상승에 사회의 탓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부와 가난의 되물림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신분상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입의 경우도 공교육 강화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짜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대입에서는 사교육을 한번도 받지 못한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지영 : 핀란드에선 한국에 비해 노력에 의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더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학생 때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막연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대학생이 되고 취업에 직면하면 그저 막연한 불안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제는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혜 : 저는 신분상승 사다리는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면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요즘은 누구나 교육받기 때문에 기회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빈익빈부익부가 더 굳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선영 : 저도 김지혜 씨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법조인 정책이 바뀐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전에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되었습니다. 분명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법고시가 로스쿨 제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등록금이 한 학기에만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3 년 6 학기를 다녀야 법조인이 되니 학비만 육천 만 원이 들어가고, 책값과 생활비 등을 더한다면 정말 큰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는 법조인이 생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선 : 박선영씨가 사법고시가 로스쿨제도로 대체되면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는 건재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도 그 취지 자체는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법률서비스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에서도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 없기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사회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가영 : 한국 전쟁이 막 끝난 후에는 모두가 가난했고, 그만큼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성공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을 끝내고 중진국의 대열에 들어서 고용없는 저성장의 긴 터널의 입구에 들어선 한국사회는 더 이상 기회의 균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층은 자신의 자녀에게 기득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고비용의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명문대학에 입학시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에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서민층이나 중산층은 신자유주의라는 가면을 쓴 유리천장에 가로막힌 신분 상승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상위 10% 이내의 부모들처럼 자녀들에게 전폭적인 교육비 지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유지선 : 많은 분들이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앞의 분들이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분명 존재했고 현재는 사회구조가 바뀌어 개천에서 용 나오기가 힘들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분명히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되고 못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과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위치가 사회의 탓도 있지만 아직은 개인의 노력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 노력여하에 따라 누구든 꿈을 이룰 수 있고, 신분 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서희 : 저도 마찬가지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무궁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만 아니라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행동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없이 할 수 없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학의 경우 집안사정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힘든 일입니다. 그 외에 대학등록금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학생에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출발선이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출발선이 다르다 하여 결승선도 출발선에 선 순서대로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례를 적지 않습니다.

김지혜 :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의 자식들은 가난한 사람의 자식보다 편하게 공부할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분상승의 벽이 좀 더 높아지고 빈익빈부익부의 틀이 굳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에서의 역할은 정해지고, 그 틀은 지금의 사회구조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사회구조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 신분상승이 가능한 실질적 평등이 작용하는 사회가 언제가는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서희 : 저는 연꽃을 참 좋아합니다. 연꽃은 깔끔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어려운 환경이기에 결국에 꽃을 피어낸 연꽃을 보면 뭉클한 감정이 듭니다. 많은 자기개발서 속에서도 연꽃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김지연 : 박서희 씨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꽃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많은 꽃들 중에 어느 꽃이 가장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봄에 피는 개나리와 진달래, 여름에 멋있게 꽃을 피우는 장미, 가을에 따뜻하게 피는 코스모스, 겨울에 피는 동백꽃. 모든 꽃은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때에 멋지게 피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람 : 저는 앞의 세 분이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존재하고 열심히 하면 신분상승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하다고 믿지만 이 사회에서 계속 오르고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유리천장에 막히게 되어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신분상승 또한 신분상승이라기보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신분 간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 이 세상은 돈이 크게 작용하지만 돈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돈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더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정있는 세대입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 우리가 기득권이 될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주축이 되어 사회보다 개인의 노력을 통한 신분상승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소라 : 모두들 열정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한다는 분도 있었고, 점점 사라져 간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분상승의 사다리라는 구조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없다며 단념짓고 포기하지 말고,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④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대기업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우리는 재벌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에서 신분상승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대학을 나오거나 고시, 대기업 입사를 통해 신분상승이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죠. 또 대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스펙을 쌓거나 안정성을 위해 고시에 몰리는 등의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학벌이나 고시는 여전히 성공이 보장되는 확실한 수단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이외의 방법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더불어 성공을 하기 위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명지대학교 학우들과 나누어보았습니다.



김서영(국어국문 3): 이번 주제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사회에도 존재하는가'입니다. 대학생의 시각에서 한국사회에 정말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존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신분상승의 사다리란 무엇이고, 신분상승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신분상승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해요.

정다래(국어국문 3): 월례토론회 영상을 보니, 과거엔 명확한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을 넘나들기 어려웠지만 현대사회는 능력으로도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열린 상태로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분은 신분과 상승이라는 말이 어떻게 신분이라는 벽이 없어진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는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과거는 출생으로 신분을 나누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부로 또 다시 새로운 신분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분상승이라는 의미가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를 쌓았다는 정도의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흔히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로 신분상승을 표현하곤 하는데, 월례토론회에서 이승훈 교수님은 지금은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이미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신분상승은 현재 젊은이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공감을 했습니다.

황규정(국어국문 4):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신분상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부로 신분이 결정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100 억 버는 갈비집 사장과 10 억 버는 의사가 있다면 사람들은 과연 갈비집 사장의 신분이 더 높다고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직업의 귀천이 경제적 자본과 맞물려 신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분상승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직업을 갖는 것이 대학생이 원하는 신분상승이라고 생각해요.

김서영(국어국문 3): 그럼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맞물려 신분상승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정다래(국어국문 3): 그것은 맞지만, 실제로 사회에 나가 소비를 할 때 사람들은 돈의 씀씀이를 보지 직업이 무엇인지는 보지 않잖아요.

황규정(국어국문 4): 하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나요,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나요? 단순히 소비를 하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다 정도만 판단할 뿐이지요.

이한별(국어국문 4): 물론 둘 다 충족되면 좋겠지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돈의 씀씀이가 적으면 배포가 적다는 소리를 듣고, 반대로 돈의 씀씀이는 좋지만 직업이 별 볼일 없다면 뒤에서는 은근히 무시하기 일쑤죠. 일단 경제적으로 풍족해야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는 더 높은 기반, 즉 사다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풍족하지 못하면 사다리가 아니라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규정(국어국문 4): 실제 우리 사회를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갈비집 사장이 아들이 있다면 어느 학교에 보내려고 할까요? 아마 좋은 대학교를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인 부분은 신분상승의 수단, 방법이 될 뿐이에요. 신분의 상(높음)은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돈이 많은 갈비집 사장이 자신의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이 많은 것이 신분상승의 결정적 뒷받침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이한별(국어국문 4): 신분상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 자체도 좀 기가 막히는데요.

황규정(국어국문 4): 물론 부정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자기 꿈을 위해 청소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실제 사회에서 신분상승을 구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서영(국어국문 3): 그렇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 경제적인 부분이 바탕이 되고 여기에 사회적인 지위가 덧붙여져야 신분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 대 대학생의 눈으로 보기에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얻으면서 신분상승을 이루어내는 사다리가 과연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김현경(국어국문 3): 저는 신분상승의 사다리라고 했을 때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 체조선수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가난한 가정환경에서도 금메달을 따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과 경제적인 후원까지 받았잖아요. 경제적인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신분상승을 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서영(국어국문 3): 김현경 학우는 개인의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신분상승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한별(국어국문 4):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재능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부는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양학선 선수 등의 경우는 그러한 기회가 적었음에도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상승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죠.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개천으로 끌려들어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또한 재능으로 신분상승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이외의 부분에서 보면, 실제로 검사나 변호사, 의사들의 경우 그 사람의 출신 배경과 집안 내력까지 따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개인의 노력과 재능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해도 그 계층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현경(국어국문 3): 저도 동의합니다. 슈퍼스타 K 를 보면 일반인이 출현하여 개인적인 재능만으로 유명인이 되잖아요. 이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신분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이외의 분야에서는 좀 희미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정(국어국문 4): 희미해진다는 것은 곧 재능으로만은 갈 수 없다는 건가요?

김현경(국어국문 3):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의사의 경우를 봐도 개인적인 공부뿐만이 아니라 대학과정에서의 학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황규정(국어국문 4): 공감해요. 수업을 들으면서 상위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고의로 '차별'을 두고 있다는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이미 의사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의사가 되지 못하도록 그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등의 차별화를 두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계가 있다는 말은 이미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예로 '패션'을 들 수 있어요. 패션계는 하나의 '유행'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 유행을 따르기 시작하면 또 다른 유행을 만들어내죠. 끊임없이 차별화를 두는 거에요. 이러한 요소가 사회의 모든 지위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한별(국어국문 4): 모두 '기득권 유지'의 일환이겠죠. 국회의원만 보아도 여야 간에 항상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권리유지 문제에서는 만장일치를 하잖아요. 신분상승이라는 것도 기득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두고 자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욕구의 수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도 기득권이 되면 보상심리가 있어서 같은 행동을 할 것 같지만..
(이 말에 모두 동의를 했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두 사람이 아닌 모두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서영(국어국문 3): 다른 분들 의견 더 없으신가요?

김종완(경제 3): 신분상승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최근 MBC 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보았는데, 40.8%가 돈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가족, 친구, 직업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돈의 가치가 크다는 의미인데요. 신분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계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인간이 모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말이죠. 예를 들어 고조선 8 조법에도 죄를 지은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조항이 있고, 신라시대에는 6 두품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현재 만인은 평등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정(국어국문 4): 그 계급이 과거에는 혈통이라는 선천적인 요소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급을 바꾸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은 후천적이고 변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즉, 신분사회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아영(디지털미디어 2): 저도 동의해요. 과거에는 신분이 묶여 있었지만, 지금은 돈과 부로 신분을 판단하죠. 요즘에도 후천적인 노력으로 신분상승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존의 기성세대가 신분상승을

이루었던 시대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한 교수님도 '1 학년 때는 좀 놀아도 돼. 나도 많이 놀러 다녔어'라고 하시면서도 '하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 1 학년 때 놀면 취업할 때 힘드니 마냥 놀 수만은 없겠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월례토론회 영상에서도 당시에는 모두 개천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용이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용이 자리잡은 곳이 더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처럼 지금은 오히려 선천적인 부분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해요.

김서영(국어국문 3): 경제적인 바탕이 있고 노력이 있으면 신분상승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은 항상 성장만을 촉구하던 과거 1970~1980 년대와는 다른 상황에 있고,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 재벌이었다든지 등의 선천적인 요소가 더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황규정(국어국문 4): 이미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에 선천적인 요소가 포함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박한진(국어국문 4):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에 가족경영을 유지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업을 계속해서 물려받는 집안을 의미하니까요.

이한별(국어국문 4): 지금 현대사회가 '급변하는 사회'라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과거가 오히려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따르면 금방 성공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하여 멈춰 고여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현존하는 대기업은 경제성장을 급격히 이루었던 시대적 상황이라는 요소가 작용하여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대 성장한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다른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어쩌면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서영(국어국문 3):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한별 학우는 급변하는 사회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정한 지위까지 올라가 고착화 되어있기 때문에 신분상승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황규정 학우가 말했듯이 갈비집 사장이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학벌로 신분상승을 많이 꿈꾸곤 하는데요. 대학 진학률이 80%가 육박하는 시점에서 학벌이 아직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종완(경제 4): 일단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뇌를 이용한 지식산업이 주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신분상승의 방법 중 하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경(국어국문 3): 신분상승의 기회 하나를 더 잡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입사를 할 때 인성보다는 학벌이 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학벌이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별(국어국문 4):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같은 학교끼리 파가 갈리곤 하잖아요. 이처럼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그 사이에서 또다시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벌도 그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경제 3): 학벌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자신의 노력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벌만 보는 사회를 탓하기 이전에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서영(국어국문 3): 저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월례토론회에서 한 분이 물론 학벌만 보는 사회도 책임이 있지만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남들과 같이 대학을 진학하는 대학생 개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리 대학생은 모두 아무런 목적 없이 남들의 시선 따라 대학에 진학한 것일까요?



박한진(국어국문 4):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대학에 가지 않은 것만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했고, 조금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목표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죠.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이나 대책은 마련해놓지 않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해요. 실제로 고졸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고졸로 입사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 상한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정다래(국어국문 3): 저도 그 말을 듣고 세대 간의 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출발선에서 이미 마이너스를 안고 시작해야 해요.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이유는 사회적 상황 때문이지요.

김서영(국어국문 3): 저도 저희 과 교수님께 상담을 받으면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이미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대기업 취직에 편승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방향조차 얻는 것이 매우 힘들죠. 하지만 교수님은 이미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 있는 기득권이시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런지 크게 와 닿지는 않았어요.

정다래(국어국문 3): 동의해요. 사회 명사들의 말을 들으면 그 분들은 저희를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보시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쩐지 저희는 기존의 기득권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에요. 기성세대로서 신세대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어막을 치고 밀쳐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황규정(국어국문 4): 매체를 보면 가난한 집안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스포트라이트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에요. 좋은 집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라 성공한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 하지 않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강조하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말을 하죠. 정말 소수의 사람인데 말이에요.

김서영(국어국문 3):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 사다리는 턱없이 적은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는 부분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생이 생각하기에 정부와 기성세대가 해야 할 노력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한별(국어국문 4):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고 나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스스럼없이 내놓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따라서 무작정 기성세대에게 자신의 지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만은 없지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한 곳에 고여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적으로는 바꿀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황규정(국어국문 4): 물론 단기간에는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과거에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면 인식이 따라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변화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이 바뀌어야 제도가 바뀔 수 있지요. 사람은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기성세대에게만 요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부터라도 인식의 변화를 갖고 다음 세대부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작은 의식의 변화가 나중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한진(국어국문 4): 평화로운 시기에는 당연히 고착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제 개편이 꼭 필요해요. 역사적으로 체제개편을 한 나라가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마련이지요. 예를 들어 불교라는 선진문물과 당나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개편한 신라가 결국 삼국통일을 이루어냈고, 근대사회에는 서양의 선진문물을 수용하여 체제를 개편한 일본도 강대국으로 성공할 수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체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황규정(국어국문 4): 과거에는 왕권이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체제개편을 이룰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적인 사회인 만큼 체제개편은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식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김종완(경제 3): 저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에 몰리죠. 교육에 변화가 필요해요. 대학진학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해요. 공교육이 부활해서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황규정(국어국문 4): 우리에게는 오직 대학입시 공부만이 있었을 뿐 정작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이제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한진(국어국문 4): 저도 인식 변화와 체제 개편의 중심에 교육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등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경제 3):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고 독일에는 칸트가 있죠.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문학을 크게 중시하지 않고 있는 듯 해요. 인문학을 공부하는 문과는 이공계에 비해 취업을 하거나 미래를 모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기성세대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공교육과 교권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요.

황규정(국어국문 4): 사실 서술형이나 창의력 시험은 평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쉽사리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교사를 평가하는데 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EBS 에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부분이 선생님이 변화하면 아이도 따라오더라고요. 교사를 평가하는 방법이 잘 가르치는 여부로만 결정된다면 그것은 결국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로만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인성도 하나의 평가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경제 3): 맞아요. 성적이 높은 아이만 우대해주거나 우열반을 나누는 등의 일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입시 시험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정(국어국문 4): 그래도 최근에 논술을 많이 보고, 입학사정관 제도가 확대되는 등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완(경제 3):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부분은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이러한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슈퍼스타 K 의 허각도 패자부활전을 통해 우승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단 한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이어지진 않았으면 해요. 동시에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으니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서영(국어국문 3): 그렇게 기업과 국민 사이에서 입장을 조율하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인식의 변화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기성세대가 벽을 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어쩌면 그들을 상대로 싸워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이니까요. 지금 우리 세대는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대부터라도 조금씩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예 손을 놓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라도 이룰 수 없듯이 우리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를 이끌어주려는 기성세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 스스로도 기성세대를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닌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새로운 길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 쪽의 노력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종완(경제 3):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학벌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는 대학생들 스스로의 의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다래(국어국문 3): 맞아요. 그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조아영(디지털미디어 2): 단기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는 창업이나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요.

박한근(국어국문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으면 해요.

김서영(국어국문 3): 네. 지금까지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활성화하고, 혹은 신분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과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먼저 정부는 각종 제도와 체제 마련을 통해 출발 선상의 동등함, 평등함 등을 맞추어야 하고, 기성세대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동시에 대학생도 지나치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길을 찾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노력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변화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이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학우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사회에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메신저로 연락을 취하고 답을 받았는데 모두의 의견은 결국 사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또는 약간은 존재하지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사회자-황재인(디미 2)
사회자: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신분 상승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민병현(디미 2):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계급을 신분이라고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 직업, 학력 등이 개인의 신분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신분상승이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교육, 혹은 개인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대중들이 인정할 만한 재산 혹은 직업군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윤(디미 1): 중산층, 서민 등 여러 계층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조건들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기준에 맞춰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중산층이고 이 정도 수준이면 서민층이라는 것을 나누었을 때 부의 정도로써 다른 사람에게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올라간다면 그것을 신분상승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와 재산의 소유로 평가되고, 지위나 능력보다는 부에 초점이 더 맞추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전다애(디미 3): 저는 신분상승과 관련하여 평등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평등이라는 개념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과 같은 곳에서는 능력에 따라 차등대우를 하는

것이 평등일 수도 있고 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똑같이 가지는 게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황마다 평등의 개념이 달라지는 사회에서 저는 신분상승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사회의 분위기가 신분상승의 욕구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살 수 있게 조성된다면,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신분상승을 뛰어넘은 모두의 신분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민(디미 4): 과거 봉건사회에서의 신분상승이란 계급의 이동, 계층의 상승 등을 말했잖아요? 하지만 현대 사회,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상승은 시골에서 태어나 자라거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피나는 노력 끝에 대기업에 취직해 빠른 햇수 안에 고위간부급으로 발돋움 한다거나, 다른 예로 '사'자 직업을 갖는다거나(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등) 고시공부를 통해 고위공무원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분상승은 과거의 계급상승이나 계층상승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대체적으로 '부'의 상승에 가치기준을 놓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신분상승은 출세를 전제로 한 '부'의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각자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현대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장과 함께 짧은 논거도 부탁드립니다.

전다애(디미 3): 저는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선 모두가 똑같은 평등의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 현재 우리는 바뀌지 않는 계급(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보이지 않는 계급)의 구조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급은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이 부분은 사다리가 있어도 쉽게 바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와 빈자로 예를 들어보자면, 가난한 사람이 사다리를 통해 3 단계 올라가면 부자는 3 단계, 5 단계 올라가는 것이 돈의 특징이자 현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신분상승의 사다리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예인, 개인의 천재성(김연아), 결혼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은 존재하기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고 분야가 너무 한정적이라 일반적인 상황에 대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강민(디미 4):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환경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분상승의 사다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단계로 나눈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괴리감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분은 과거에 하층민과 상류층을 나눠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사회참여 기회를 다르게 관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시대인데 이것은 시민을 사회적계급으로 나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대윤(디미 1):저는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 사람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고 높은 직위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늘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허나 저는 이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들보다 상류층, 그러니까 이미 높은 신분을 얻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현(디미 2): 과거 고대 사회 혹은 봉건 사회에서는 부모의 지위 혹은 신분을 자식이 귀속적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현대사회에서는 그 가능성이 보다 열려있으므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90 년대 당시의 한국 사회와 비교하면 21 세기 한국은 사교육 중심의 교육시스템, 낮은 창업률 등으로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오르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현대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과거와는 다르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다애(디미 3):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장애인, 고아, 노인과 같은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즘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많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 이는 계급 타파를 위한 과정의 단계라는 시선이 있지만, 저는 이에 대해 겉치레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회적 약자들 또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지만 이것이 계급의 고착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보다 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편견의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사회적 약자를 더욱 약자로 바라보게 하는 위험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강민(디미 4): 과거에 비해서는 계급 고착화가 덜 존재하나 여전히 그 뿌리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명 '낙하산'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노력없이 연고관계를 통해 불공정하게 사회참여이익을 챙기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사실이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있지만 아직 평등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현(디미 2): 상대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고대 사회, 봉건 사회와 현대 사회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개개인에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60~90 년대 한국사회와 21 세기 한국사회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과거보다 현대 사회에서 평등이 보장된다는 것은 같지만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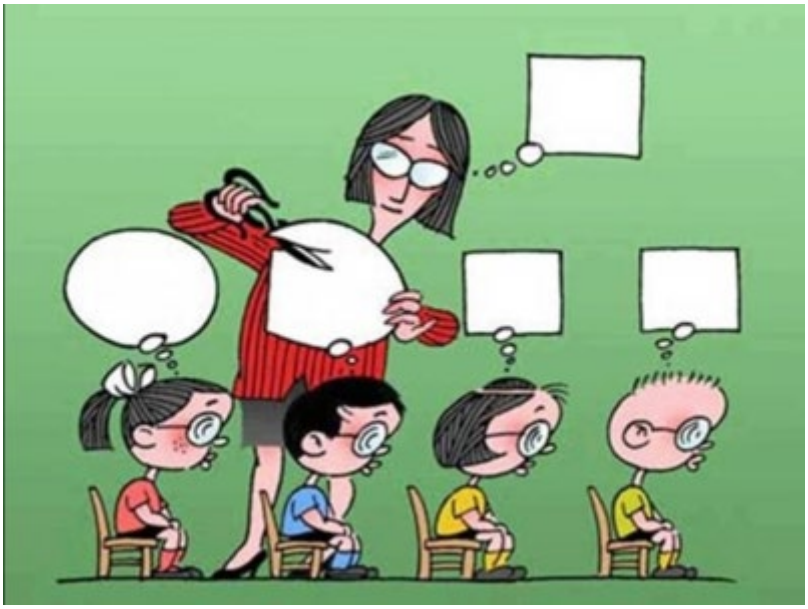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층의 자녀들이 100 의 기회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빈민층의 자녀들은 그 10 의 기회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경제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자녀들과는 다르게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에 제약을 받고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자기계발을 하는데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교육'을 꼽는 토론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문제점은 어떻고 어떤 점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김강민(디미 4): 현대 교육의 최대 문제점은 목표가 단 한군데에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입시'라는 목표만 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 총 12 년을 투자하는데 그 과정에서 입시를 위해 종합학원을 다닌다거나 영어, 과학, 수학 등 주요과목들에 대한 공부를 위해 과외를 시키고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아이들은 쉴 새 없이 공부하고 그러는 사이 본인들의 적성도 모른 채 점수에 맞춰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에 들어가 방황할 수 있으며 또한 오로지 '입시'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은 자살이나 삶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어렵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점은 이처럼 획일화된 교육, 공교육의 약화, 사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입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이나 다양한 문화체험 등이 학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루지 못한꿈을 아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아이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자신의 인성이나 적성을 키우는 일을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참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경쟁을 가르치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와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는 아직까지도 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현(디미 2): 대한민국에서 교육이라 함은 대다수가 흔히들 말하는 국영수, 즉 공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야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반적인 시각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약 만 여개가 넘는 직업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공무원, 대기업 입사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몇 가지의 직업군만을 선호하고 있는 세태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직업군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하고 또 전문적으로 그 직업군들로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화 학교나 특목고와 같은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윤(디미 1): 김강민 학우의 말처럼 모든 학생들은 오로지 입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에 임합니다. 정형화된 공교육 체계에서 많은 아이들이 똑같이 배우고 똑같은 기회를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상류층의 아이들은 흔히 말하는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교육, 사교육을 받으며 대입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위치를 가집니다. 게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층의 학생의 경우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사학위를 따지만 하위층의 학생이 있는 반면 부모님께 돈을 받으며 여유롭게 학사학위를 따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것이 계급 간의 시작점이 다른 것이 나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에 대안은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정형화된 공교육의 체계는 많이두되 호기심과 적성을 좀 더 무기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대학의 학부처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적성검사 후에 다양하게 교육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어떠한 교육이든 사교육이 존재하지만 학교 평가 체계에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도록 평가우위를 둔다면 어느정도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없다.‘라는 의견에 반해서, 아직 사회는 여전히 희망적이고 역동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강민(디미 4):우리 사회는 아직 희망적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이유인 즉슨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산업화사회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작은 땅덩어리에서 대단한 산업화를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 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직 앞만보고 달려오신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세대의 소통을 가로막은건 바로 급변한 한국산업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같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어른들과 젊은이들은 서로 다른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지식하고 정지된 사고 속에 사는 어른들을 이해 못하고 어른들은 본인들이 살아왔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던 행동을 하고 사는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어른들과 오로지 학교, 학원, 집을 오가며 살아온 젊은 학생들 사이에는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만한 교집합점이 없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위해 보낼 수 있는 시간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시점에서 과연 한국 사회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소통’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돌아 볼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젠 수면위로 드러난 이 문제를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간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민들은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소통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다애(디미 3): 희망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는 지배층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고 토론 주제와 관련이 있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부분과 관련해서 지배층은 희망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회에 불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급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허상은 결국 지배층들에게 좋은 작용을 할 것이고 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원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윤(디미 1): 아직은 희망적이고 역동적이라 생각하나 지금과 같은 사회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조차도 점점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회에서는 복지 등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알고 해결해 나가려는 점은 아직은 그래도

희망적이고 역동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같이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후에는 더 나은 사회로 더 진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⑤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끝난 것일까. 경쟁은 과열돼 있고, 사회 구조 역시 이런 과열을 컨트롤 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숭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았다.

〈토론 전문〉

진행자: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중에 신분상승 가능성의 문제를 고민해보면 개인의 노력이 영향이 있다, 또는 사회 구조가 개인의 노력을 소용없도록 만든다는 의견이 분분한다. 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먼저 '신분상승'이라고 함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서민규:
신분상승이라는 건 예를 들어 아버지가 힘들게 일을 하면서 자존감도 없는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자식 세대가 아버지 세대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서 생활하게 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박지원:
그렇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골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나는 꼭 같은 계열은 아니더라도 이를 테면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마트에서 간부급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금재민:
앞에 두 학우의 말에 동의한다. 아버지가 슈퍼마켓을 운영해도 아들은 검사가 될 수도 있는 게 신분상승이라고 본다.

진행자:
신분상승을 대체로 수직적 이동의 예를 들어주면서 설명을 해주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분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바탕으로 각자의 의견을 말해달라.

금재민:
신분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케이스가 많다. 요즘엔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별로 없지만 여전히 가능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신분상승이 가능한가 아닌가의 문제보다 얼마나 가난한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민층을 놓고 봤을 때 중산층의 학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역전이 가능하다. 자기가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노력이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서민규:
불가능하다. 현재 기득권층의 조기교육은 무시할 수 없다. 조기교육을 받지 못한 서민층의 학생보다 조기교육을 받은 중산층 이상의 학생은 비교적 덜 노력한다 하여도 기본적인 바탕을 깔게 되는 것이고, 나중이 되면 이런 밑바탕은 개인의 노력 여부에 대한 영향을 무마시킨다고 본다. 결국 세습이 더욱 견고해지는 구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본다.

박지원:
불가능하다. 개인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산층 가정의 학생은 유학을 간다던가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단 남들보다 한발 앞설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신분상승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진행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자 한다. 신분상승 불가능의 전제가 집안 배경이라는 요소라는 의견이 계속 나왔는데, 가난은 상대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재민:
물론 가난은 상대적이다. 그러나 앞서 말이 나온 것처럼 정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아 학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라면 그게 가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서민규:
동의한다. 공부를 하려고 하거나 책을 사려고 할 때 머리 한 켠에 항상 알바를 생각하고 있어야 할 때 거기서 가난의 여부가 갈리는 것 같다. 알바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껴보지 못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다. 또한 알바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봐야겠다는 사람과 생계형 알바인 학생들의 차이가 가난을 기준 삼는 것 같다.

진행자:
신분상승을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이다. 우리나라는 한때 창업 붐이 일어났다가 침체기를 걸었고, 최근에 와서 다시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창업에 도전하는 것 역시 신분을 상승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지원:
창업해서 성공할 수는 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본다. 대학생 그리고 20 대의 나이에는 노련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

진행자:
노련미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말했는데, 창업을 위해 기업에서 멘토링 역할을 해주는 등 나름대로의 정보전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움직임 등이 있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면 개인의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지원:
그런 프로그램은 노하우에 대한 지원에 불과할 것 같다. 또한 아무리 질적 지원이 풍성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건 자금의 지원이다. 돈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면 노하우건 노련미건 간에 학생 입장에서는 신분을 상승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진행자:
벤처중소기업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서민규 학생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민규:
돈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는데, 나는 돈의 지원이 커져도 창업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건 어렵다고 본다. 우리 학과는 10 여 년 전에 창설되었다. 아마도 창업 열풍에서 한 몫 해보려는 학교의 전략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사회 풍토가 학생들의 도전 심리를 줄어들게 만들었다. 그런 풍토 때문인지 아이러니하게도 벤처학과인 우리 학과에 현재 창업을 해보겠다는 꿈을 가진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창업에 올인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우리나라는 창업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 “창업 한 번 해볼까?” 이런 시도에 대한 생각을 하기까지가 너무 먼 게 현실이다.

진행자:
창업을 공부하는 학과에 창업 준비생이 없다는 건 씁쓸한 사실로 느껴진다. 학생들의 도전의식을 사라지게 한 사회적 환경 역시 냉정하게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이제는 신분상승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움직임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금재민 학우부터 말해달라.

금재민:

나는 신분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식 전환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희망을 주자는 것이다. 사회적 환경은 젊은이들이 너무 풀이 죽게끔 조성돼 있다. 그런 것과 또 개인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신분상승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외로 우리는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다. 비록 대출제도이기는 하지만 학자금 대출과, 교내 장학금 등이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으니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좀 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지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여전히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다는 걸 모르는 학생이 많다. 개인들에게 그런 부분을 광고를 통해서 인식전환 및 정보를 전달하는 움직임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민규:
고학력 고스펙을 원하는 시대다. 아무리 학벌을 보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여전히 극히 소수의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기업을 비롯한 고용시장에 있는 주체들이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여 서류를 보기 전에 먼저 인터뷰를 하면 상당부분 학벌로 인한 필터링 현상이 줄어들고 그게 곧 우리 사회가 당착해 있는 신분상승이 정체돼 있는 이런 현상을 변화시키는 데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진행자:
결국 신분상승이라고 했을 때 개인의 노력은 기본적인 전제로 가정하고, 이에 더하여 국가적 움직임이 좀 더 활성화되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신분상승이 가능한 사회가 될 것으로 방향이 좁혀지는 것 같다. 시대적 운을 타서 조금만 공부해도 신분상승이 가능했던 시기는 이제 지난 만큼 개인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닌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주는 국가의 역할을 앞으로 기대해보도록 하자.

숭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개인이 노력을 전제로 하여 국가적인 도움이 행해질 때 개인은 더욱 시너지를 얻어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여 소득분위를 통해 가난의 정도를 확인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가난은 상대적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힘들게 살아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니 개인 역시 지나치게 국가의 도움에 의존하려는 자세보다 열심히 하여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갈 때에 우리나라가 비로소 신분상승의 문제가 완만해지며,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되었다.



⑥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9 월 14 일 금요일 경북대학교에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새로 꾸리는 모임이라 처음에는 난항이 많았습니다. 우선, 학교 커뮤니티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지원해주셨습니다. 그 중 10 분을 모아 경북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은 경북대학교 경상대 강의실 219 호에서 늦은 6 시(9 월 14 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2 분은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뵙는 서먹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렇다면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한국에는 존재하는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원(경영): 안녕하십니까,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에도 존재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과거 1980 년대까지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신분상승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보였습니다. 1 세대 자본가 계급이나 중산층 중 자주성가한 사람이 바로 사례에 속합니다. 그러나 1990 년대 이래 교육혁명과 노동시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노동을 통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에 대한 원인에 대해 논의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김시영 씨가 먼저 말해주시죠.

김시영(경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득권층이 80 년대까지는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기득권층이 기반을 잡고 확고해져서 고착화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층이 단단해지자 아래에서 위로 유입되지 못하고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도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의 증가로 인해 교육조차도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아닌 신분상승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윤(경영): 고등교육이 예전보다 훨씬 일반화가 되었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져서 노동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노동시장이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은 심해지고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두 스펙쌓기에 열중하고 거기에서 또 신분의 격차가 나기 때문에 교육이 신분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기범(전자): 교육이 기회가 확대된 것이 교육불평등을 확실하게 약화시키긴 했지만 그 과정에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장되고 그 요인들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지, 그것이 신분상승의 기회를 막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혜인(경영):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긴 했지만,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학교 공부에는 조금 소홀했고 사교육에 더 치중했습니다. 학교 교육에만 의존해서 소위 말하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불평등이 형식적으로만 약화되었지 실제로는 심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원(경영): 그렇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수정(경제통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교까지의 교육기회 확대로 인해 나오는 그 인력을 수용할 만한 일자리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직업을 크게 둘로 나누면 화이트칼라(사무직)과 블루칼라(노동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블루칼라 쪽은 어릴 때부터 숙련공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낫지 굳이 대학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육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전자): 지금 대학 교육을 보면 취업했을 때 배운 내용이 과연 도움이 될 지 의문입니다. 대학은 그저 취업의 등용문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반값등록금보다는 취업기관을 양성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원(경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이 취업을 염두에 두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맞춰 대학 졸업 정원의 축소와 과 폐지 등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시영(경영): 저는 대학교가 반드시 취업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해봄으로써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정원 축소로 오히려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막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전자): 대학교에서 꿈을 찾는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 저희 초중고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초중고 교육 모두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맞춰 대학 졸업 정원을 축소한다는 것도 경쟁을 야기시키는 것 같아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경제통상): 지금도 전체 고등학생 중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교과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인원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애초부터 대학교를 줄여서 아예 대학교 들어가는 인원을 줄인다면 대학 졸업자들의 경쟁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지(영어교육):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정원을 축소한다면 노동시장과 정부 입장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낙오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고 대학을 안 가도 된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선(간호): 저희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물론 대학을 나와야 더 좋은 직업과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이 본질은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본질이 아닐까요? 항상 대학의 구조개혁에서 초점이 맞춰지는 건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대학을 가는지 본질을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정원(경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개혁하기 위해 학교 간의 경쟁을 신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기범(전자): 지금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굳이 더 경쟁을 시켜서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할 텐데 그렇다면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선(간호): 학교 간의 경쟁을 신장하는 게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변 학교와의 경쟁이 심해서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는 것을 지나치게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 하에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올리기를 바랬죠. 오히려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민지(영어교육): 저는 이 학교 간의 경쟁을 학업 측면만이 아니라 마에스터고처럼 전문직관련 교육에 대한 측면도 신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직업을 선택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적성교육과 자아관련교육을 선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경선(간호): 마에스터고나 전문직관련 고등학교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한은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기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정원(경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을 나와도 사회적 성공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 서울지방법원에 개인신용회생절차를 신청한 사람 중에 절반이 전문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전문직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태가 왜 벌어지고 있을까요?

김태석(전자): 전문직이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와 변호사에 대한 인원을 제한한 이유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나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중산층에 진입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혜인(경영):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저는 사회적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 회사에 서류를 냈는데, 소위 말하는 sky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먼저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가서 질문도 못 받고 탈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수능으로 이 같은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전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980 년대까지 급격한 성장에서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겪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0 년대 이후 IMF 와 여러가지 위기가 많이 왔습니다. 위기로 인해 고용시장의 불안이 초래되고 노동시장도 경직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고용의 불안이 소득의 불안이 되고 그로 인해 신분상승의 사다리도 약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학교도 1990 년대 이후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졌는데 노동시장은 바뀌지를 않아서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수직분화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시장부터 수직분화가 되어 있으므로 신분고착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지(영어교육): 노동소득 분배율을 봤을 때 자본가가 갖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저희 나라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이고 일자리도 대기업과 공기업은 소득이 높고 중소기업은 낮은데 이것을 바꿀 수 없는 트렌드라고 취급하는 것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원(경영): 그렇다면 교육경쟁이 사교육비 지출로 연결되는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발전시킬 순 없을까요?

권수정(경제통상): 친구가 교생실습을 나갔는데 수업을 제외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선생님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만 신경을 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혜인(경영): 일단, 지금 공교육은 적성파악이 아예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따라 과를 선택하고 진로를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직업이나 적성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경제통상): 저는 작은 농촌 출신인데 그 곳에는 중학교도 한 개, 고등학교도 한 개였습니다.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고등학교와 전문고등학교의 수를 조금 늘려서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석(전자): 공교육의 발전은 노동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래서 수능에 없는 과목은 등한시되는 거죠. 그런데 반해 대학교에 오면 또 여러가지 스펙 쌓기에 연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는 수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다른 여러 과목들을 고루 가르치고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전자): 그 말도 옳은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논술, 수능, 내신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습니다. 논술, 수능, 내신 모두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다양한 과목들의 중요성을 키우는 의도는 좋으나 그로 인해 뭐든지 다 잘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정서상 더 큰 사교육비 지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의 수능을 유형문제가 아닌 사고력 증진 쪽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차이를 없애는 거죠.

이민지(영어교육):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변별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입시를 볼 때는 수능이 쉬워서 '물수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진학에도 더 곤란을 겪었죠. 점수가 차이가 없어서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보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원(경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분야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노동시장은 경직성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것이 계층고착의 원인일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권수정(경제통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층고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선 발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분야가 그 분야로 압축돼서 옮기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소득집단과 저소득집단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전자):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현 상황을 볼 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경제통상): 부유층들은 대학을 다닐 때도 여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등록금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니까 하루에도 알바를 3, 4 개씩 뛰고 그러면 공부할 기회는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전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도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층들이 비정규직을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형태가 양산되고 고용의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호윤(경영):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서로 비슷한 위치의 사람들끼리 하게 됨으로써 서로 섞이지 않고 부유층의 자녀들은 더욱 더 부를 축척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나왔듯이 8 살 아이의 주식 보유액이 270 억 원이 넘는 이런 상황은 정말 해소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김정원(경영): 네, 알겠습니다. 노동시장이 공급중심적이라 수요가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좋은 일자리 대신 질 낮은 일자리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질 좋은 일자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시영(경영):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우선 연봉이 좋고, 자신의 여유도 찾을수 있는 직장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수정(경제통상): 어느 정도의 정년도 보장되면 더 좋겠죠.

김정원(경영): 그렇다면 질 좋은 일자리를 증가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태석(전자): 제 생각엔 질 좋은 일자리라는 말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이나 다른 직업 모두 사회에 필요한 직업인데 여기서 질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 좋은 일자리라는게 적게 노동하고 많은 연봉을 받으며 자기 여가시간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리 같은 경우는 무한정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영을 하는 쪽의 일자리를 무한정 늘일 수는 없는 거죠.

박기범(전자): 우선 실패를 용인해주는 사회의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취업말고도 창업이라는 다른 길이 있는데 취업에만 몰두하는 이유는 창업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원(경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 심화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파산이 증가하고 '자영업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기범(전자): 현재 자영업의 대부분이 비슷한 업종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것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경선(간호):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분야가 포화 상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내새울 수 있는 게 IT 나 몇 가지 품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필드를 개발해서 그 쪽 분야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전자): 저는 자영업의 미래가 없다는 이 문제에서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자영업에서 프랜차이즈가 점점 지배해 나가고 규모의 경제로 가격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주위를 둘러봐도 대부분이 편의점이지 동네 슈퍼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빵집은 더 심하고요.

권수정(경제통상): 대기업 규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찾는게 그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영업도 특색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을 박기범 씨가 말하신 것처럼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하구요.

박경선(간호): 차별화된 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당장 먹고 살 것이 막막한 자영업자들에게 그건 조금 힘든 요구가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원(경영):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한국 사회 신분상승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혜인(경영):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비정규직 같은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전자): 범죄 같은 경우도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 제도적으로 너무 관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서혜인(경영): 제 친구 중에 21 살에 인터넷 대학을 나와서 CPA(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지만 회계법인에서 면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사회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민지(영어교육): 대부분의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은 지방지역 사람들이 인턴 생활을 하려면 서울까지 올라가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지원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기회의 차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선(간호): 임금의 차이가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 같습니다. 자본주의사회이다 보니 돈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서 결국엔 임금의 차이가 신분의 차이까지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임금에 따라서 신분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는, 그에 따라 불화가 생기고 나눈 계층끼리 불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권수정(경제통상): 사람들이 임금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임금밖에 기댈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형식으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원(경영):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경제 위기로 인해 고용에 대한 불안이 증폭됨으로써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경우에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는 메가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약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고치려면 우선 경제위기의 극복이 우선시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⑦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민숙희(영어 3): 안녕하세요. 한국선진화포럼 10 기 민숙희입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에도 존재하는가?' 입니다. 월례토론회 동영상에서 조전혁 교수가 대한민국은 교육 투자비에 비해 국민의 교육 만족도는 저조하고 오히려 불만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제도에서의 지나친 규제, 관료화. 즉, 필요 없는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대학생의 입장에서 현재 대학 관련 제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김현정(외교 2): 대한민국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조전혁 교수의 말에 동의합니다. 정부의 대학개혁을 떠올리며 부실대학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부실대학의 퇴실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8 개의 대학이 퇴실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 발전이 없었고 문제가 있었기에 퇴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성경(외교 2): 주제가 어려워서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해 보았는데 부실대학 8 개 대학이 퇴출이 되었는데 비리로 인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부실 대학 선정과 퇴출에 대해 찬성합니다. 또한 다른 대학이 비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숙희(영어 3): 대학 퇴출의 이유가 꼭 비리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주성경(외교 2): 비리문제도 있고 재학생을 충원하기 힘들다던가 대학의 재정 문제로 인해서 퇴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지연(외교 2): 저는 현재 정부가 반값등록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부실대학을 없애는 것에 반대합니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 등록금을 다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해림(외교 1):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구시대적 발상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고 결국 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대학의 축소를 찬성합니다.

김샛별(외교 2): 방금 봤던 동영상에서 신분상승의 기회를 교육이라고 하셨고 따라서 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서도 50~60%정도의 학생만 대학진학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즉, 대학 졸업자 50~60%만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다는 약간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신용원(외교 4): 저는 반값등록금을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록금을 1000 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숙희(영어 4): 흥미롭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신용원(외교 4):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천 만원을 내고 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천 만원 내고 다닐 것입니다. 대학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직업을 얻을 수 있다면 부실 대학 퇴출도 찬성합니다.

박창일(외교 1): 현 정부의 대학개혁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 OECD 국가 중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1000 조 원으로서 등록금 마련으로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이보은(외교 1): 제가 대학생의 입장으로 반값등록금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 학기에 300 만 원씩 졸업 때까지 2400 만 원 정도를 내는데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졸업 후 바로 취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많은 분들은 자녀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현정(외교 2): 맞습니다. 장학금을 타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성적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반값등록금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숙희(영어 3):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학교라는 정규 교육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대학 4 년 동안 졸업을 하기 위해 많은 빚을 지고 졸업 후 사회에 나와 빚을 갚으면서 언제 중산층이 되고 살아갈 수 있을 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할까요?

김현정(외교 2): 대학 구조조정은 일단 찬성입니다. 하지만 부실대학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민숙희(영어 3): 정확히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현정(외교 2): 부실대학을 결정짓는 조건이 대학의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그리고 학사관리나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8 가지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모두 서울로 진학하고 싶어하는데 지방대는 상대적으로 신입생 충원 자체부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성경(외교 2): 동의합니다. 예술대학 같은 곳은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박창일(외교 1): 지난 한해 14 조 원의 등록금을 냈고 장학금이 3 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 11 조를 학생들이 낸 것인데, 일단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국민 세금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부족해서 부실 대학 위기에 처한 대학들 말인데요. 출산율 감소 등으로 10 년 후 고졸자가 모두 진학해도 대학이 다 차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통폐합과 인수합병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해림(외교 1): 각 지방에 특성화된 대학을 하나씩만 만들어 더욱 각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되면 대학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슬희 (외교 1): 우리나라 대학은 뚜렷한 분야를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무작정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자는 약 67 만 명 정도인데 이 졸업자들에게 모두 이익이 가도록 하는 개혁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샛별(외교 2): 대학 졸업자가 보편화 되면서 대학 졸업을 해야만이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다고 사회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국 대학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선별 정책이 유지되고 대학 입시의 자율화에 대해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등급제가 시행이 된다면 대학을 가기 위해 대학에 필요한 사교육을 하게 되고 그 대학만을 위한 입시제도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달린 대학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원(외교 4): '개나 소나 대학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는, 목적이 있는 대학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를 예로 들어보면 외국어대학에서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데 요즘에 언어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토익, 컴퓨터 자격증을 따고..

민숙희(영어 3): 목적 있는 대학 진학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요? 각자의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신용원(외교 4): 취업도 중요하지만 또한 지방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방대가 발전하면 지방산업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학을 가는 이유는 제도적 여건이 좋아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과 기업에 특성에 맞게 대학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숙희(영어 3):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과반수의 분들이 현재 대학 제도에 대해 불만을 보이고 대학 개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⑧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9 월 12 일 수요일 늦은 6 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은 선진화 연구모임을 위해 모였습니다. 바쁜 시간임에도 토론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는 높았습니다. 특히 신분상승이라는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았는데요.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평소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지내는 학생들이 모여 함께 한 토론인 만큼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유주원(영문) :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 사회를 맡은 유주원입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은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사회에도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민주공화국을 주창하며 예전 전통 신분사회처럼 표면적으로 신분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주제에 '신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소위 계급 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 '신분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경민(스크랜튼) :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재산과 학력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신분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학력, 재산, 직업 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임성은(영어교육) : 맞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다양한 환경이라는 것이 상위계급과 하위계급의 차이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계급은 계속해서 그들의 자리를 지키려 하고 하위계급은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지요.

서연수(사회과학) : 신분이라는 용어가 현대 사회에 와서 다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전체 사회에서 자신의 소위 '신분'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생활하잖아요. 그에 따라 생활 모습도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정경민(스크랜튼) : 맞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 같은 학과의 아이들을 보면 특별히 잘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 말투가 저랑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 가방임에도 아무렇지 않게 이제 그 가방은 질려서 다른 것으로 바꿔야겠다든지 등의 말을 할 때는 정말 같은 학교에서 같이 수업 듣고 생활하는 학생임에도 학교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계급 차이가 존재한다고 실감하게 되고 그래요.

유민경(사회과학) : 아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국제학과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학과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과 특성상 해외에 살다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외 유학을 다녀오는 것이 당연시 되다 보니, 오히려 국내에서만 살았던 소위 '토박이' 친구들을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눌 때도 은근히 해외에 나가보지 않았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일부로 더 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솔직히 해외 유학을 다녀오고 하는 것이 본인의 능력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한국에서 국제학부라 그러면 능력이 뛰어나고 좋은 학과를 다닌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물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인 건 맞겠지만 사실 그것도 백프로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외 유학을 다녀오면 아무래도 영어를 더 유창하게 잘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대부분 국제학부는 영어 실력으로만 선발하잖아요. 그 덕을 보고 쉽게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센 것 같은데, 제 말의 요지는 정말 실생활에서도 그런 신분의 차이를 느낄 때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유주원(영문) : 그렇습니다. 실제로 같은 주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 67 차 월례토론회에서도 한 청중 분이 질의 응답 시간에 '신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현대 사회에 왜 이런 용어가 쓰여야 하냐며 다소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만큼 민감한 단어이지만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부분인 듯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처럼 본인이 열심히 한다면 신분상승이 가능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신분 상승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성은(영어교육) : 사실 전 좀 회의적이에요.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우선 시도해 볼 기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그런 최소한의 기회조차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등 소위 '고시'들을 합격하면 사회에서 인정 받는 직업을 가지고 권위를 인정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것도 다 옛말인 것 같아요. 사법고시의 경우 곧 폐지되고 로스쿨(law school)이 대체하잖아요. 그런데 로스쿨이 생기면 이젠 정말 개천에서 용 날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로스쿨을 가려면 일단 학부를 먼저 졸업한 뒤에 또 로스쿨을 다녀야 하잖아요. 요즘 대학 등록금은 다들 얼마나 비싼데요. 더구나 로스쿨은 일반 학부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유주원(영문) :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법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 어릴 때는 사법고시를 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로스쿨이 생기면서 조금 멈칫했어요. 저희 집은 사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부를 다 졸업하고 또 로스쿨을 엄청나게 비싼 등록금을 주고 다니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국공립 로스쿨 연간 등록금을 보니 최소 800 만원 대에서 최고 2000 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인상될 가능성도 있고요. 정말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완전히 간 것인가, 이제는 부모가 잘 살아야 자녀들도 공부하고 좋은 직업 가질 기회가 생기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암울해지던데요.

정경민(스크랜튼) : 그냥 상위 계층끼리 그 안에서만 이동만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형성된 상위 그룹 내에서의 이동 말이죠. 그들만의 리그, 뭐 이런 개념이랄까.. 하위 계층은 감히 경쟁에 끼어들 생각조차 못하는.. 너무 우울한가요? 사실 이렇게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희들도 저희보다 훨씬 힘든 생활을 하는 최하위계층의 사정을 잘 알지조차 못하잖아요.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도 이 정도인데 그들은 어떨까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신데,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일들을 하잖아요. 한 번은 각 학교 별로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내는 작업을 하신 적이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차상위계층이 정말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었대요. 다른

학교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고등학교에서부터 계급 간 격차는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외국어고등학교가 대학 진학 성적도 좋고 하잖아요. 그만큼 학구열도 높고. 그런데 그런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정 형편이 돼야 하고.. 그것이 대학 진학 성적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취업으로 연결되고. 악순환인 것 같아요.

임성은(영어교육) : 아 맞아요. 사실 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도 너무 늦고 중학교, 심지어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 환경에 따른 격차가 나뉘는 것 같아요. 사립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등등 상위 그룹끼리 뭉치려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부모 세대에서 나는 차이가 고스란히 자녀 세대에 전해지는 거지요. 출발선 자체가 달라요.

유주원(영문) :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 이야기가 나왔으니 교육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월례토론회에서 교수님들은 대학 교육이 신분상승 사다리로 올라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 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서연수(사회과학) : 대학이 제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찬성합니다. 제가 기대하고 왔던 대학교의 모습이랑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업 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수업이랑 대학 수업은 완전히 다를 줄 알았거든요. 좀 더 깊이 있고, 또 전공이 정해지니 원하는 것을 심도 있게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했는데 그렇지 만도 않은 것 같아요. 깊이가 더 있는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오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지 않고 한 번 만들어놓은 수업 자료들을 수정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직업 교육, 이런 면에서는 정말 꽝이죠. 대학교에 오면 직업 세계를 좀 더 넓게 알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다들 원하는 직업은 그냥 널리 알려져 있는 직업들이고. 어떤 분야에 어떠한 직업들이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임성은(영어교육) : 아 맞아요.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라에 직업 자체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직업들이 있을텐데.. 그에 대해 학교가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유민경(사회과학) : 학교 수업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으니 거기에 덧붙이자면, 정말 대학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한정된 시간에 널널한 수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수업시간에 전달받는 정보들도 과연 고급 정보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들고. 시험 며칠 전에 바짝 암기 하는 과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깊이가 없다는 거지요. 교수님들도 정말 열성적이신지도 모르겠고. 이러니 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나중에 취업 시장에 나가서 적용할 수가 없죠.



유주원(영문) : 다들 대학 교육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이는 대학생들 입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이 신분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경민(스크랜튼) : 예전에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일단 대학교에 진학하는 인원 자체가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으니까 대학교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소위 '스펙' 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대학교 진학은 당연한 거고 오히려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이 실패한 것이라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각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말했지만 수많은 직업들이 분명이 사회에는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직업들도 있을테고. 그런 여러 직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해주어야 사회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건데 무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임성은(영어교육) : 맞아요. 나라의 분위기가 교육만을 중시하다 보니 교육을 받고, 그것을 이용해서 가지는 직업 분야만 괜찮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소위 선망받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 당연시되는 코스가 은연 중에 존재하잖아요. 좋은 학력을 취득한 다음 권위 있는 직업을 가지는 거요. 결국 좋은 직업이 그 사람의 사회에서의 신용 등급을 보여주고 부의 축적이 되고.. 모두 하나의 점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신분상승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이 마치 당연히 거쳐야 할 코스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각도 바뀔 필요가 있어요.

서연수(사회과학) : 특히 요즘은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당연시되다 보니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대학교를 진학한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고, 소위 '스펙 경쟁'에 돌입해야 하니까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또 다른 경쟁 세계에 뛰어 드는 거죠. 이미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대학 순위가 나뉘어져 있는 학벌주의 사회에서 대학 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신분상승을 기대할 수 없죠.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스펙을 갖춰야 한다고 여겨지다 보니 이곳 저곳 스펙을 위해 뛰어다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누구를, 무엇을 위한 노력인지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 모두가 처한 현실이죠.

유주원(영문) : 모든 문제들이 결국 대학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일부 대학을 폐지하는 등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학 혹은 더 나아가 우리 나라의 교육 방향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민경(사회과학) : 솔직히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학교가 너무 많아요. 우리 나라 대학 진학률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전체 학생 수보다 대학교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많다는 말들이 있을 만큼 사실 많은 대학교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대학교의 정원도 너무 많아요. 우리 학교(이화여대)의 경우만 해도 총 정원이 3000 명 가까이 되잖아요. 대학교의 정원을 줄이고 대학 수도 줄여야 해요.

정경민(스크랜튼) : 이 시점에서 개혁은 필수인 것 같아요. 대학 정원과 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 학생의 적성을 찾아 주는 교육이 진짜 필요해요. 교과 시간을 줄이기 어렵다면 개발 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서 적성 시간을 주당 1 회 정도로 해서 정규 과정에 넣는 거죠. 실제로 유명 음악가 등의 자기 위치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소한 계기에서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적성 시간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고 자신이 흥미 있고 잘 하는 분야가 뭔지 알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듯 해요.

서연수(사회과학) :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학생 담당 교사를 따로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담임 교사가 있긴 하지만 교사 하나 당 학생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적은 수의 학생을 담당 교사가 맡으면서 좀 더 깊은 곳까지 세심하게 케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로 교사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임성은(영어교육) : 실제로 요즘은 교육청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중학교에서 진로 교사로 근무하고 계신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특별 진로 체험 교육이 있대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예산이 내려와서 학교에 직업 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경험해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체험 부스가 꽤 구체적이고 제대로 돼있나 봐요. 제빵 등의 요리 분야부터 방송, 기계 등의 분야까지 다양한 직업 경험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러한 직업 교육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실제로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유민경(사회과학) :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도 많은데 사실 공교육을 통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얻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신분상승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힘들잖아요. 이미 사교육은 우리 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퍼져있는 상태고 아예 근절시키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꾸준히 찾아보고 실행하도록 해야지요. 그런 점에서 교육청 차원의 직업 교육이라든가 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유주원(영문) : 토론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각자의 노력을 통한 '신분상승'에 대해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임성은(영어교육) : 안타깝지만 현실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기 보단 늘려가고 싶어하니까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게 씁쓸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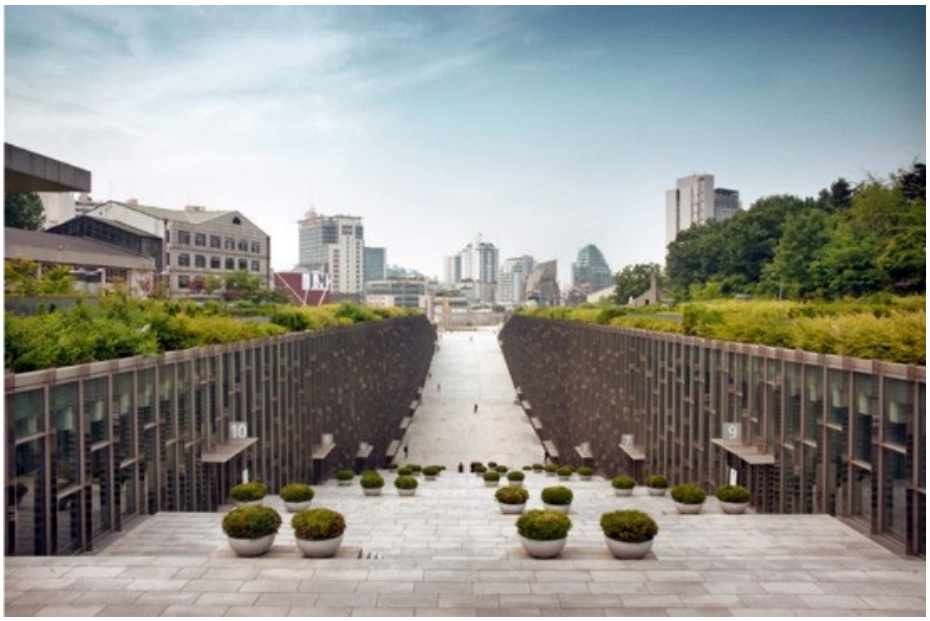
서연수(사회과학) : 저 역시도 신분상승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예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외삼촌을 예로 들고 싶은데요. 40 대 초반으로 우리 세대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외삼촌 가정 형편이 엄청 안 좋으셨거든요. 외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오롯이 삼촌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금 변호사로 상당히 여유롭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이처럼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희박하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 회의적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다들 조금씩 힘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유주원(영문) : 마지막 마무리가 훈훈해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다양하고 솔직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사회가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루어진 토론에 힘드셨을 텐데 솔직하고 열심히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선진화 연구 모임 때도 진솔하고 깊은 토론으로 만나기로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2012 년 9 월 9 일 고요해야할 주말의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현대 한국사회의 신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사회의 신분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신분의 벽을 허물려는 해법의 제안까지 풀리지 않는 퍼즐과 같은 사회 문제를 여러각도에서 접근해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화여대생들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의 신분에 대한 토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제 11 송민영: 안녕하세요.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이화여대 내의 연구모임 주최를 맡게 된 국제학부 11 학번 송민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할 주제는 한국에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존재하냐는 것인데요. 먼저 신분이라는 것과 사다리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현대 사회에서도 신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현대의 신분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신분이 존재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다리가 존재하는지, 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11 김태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현대 사회에서 신분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신분은 사회적인 면, 그리고 경제적인 면을 융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월례토론회 동영상을 보고 교육이나 노동을 통해 얼마나 사회적인 위치나 경제적인 위치를 올릴 수 있느냐가 현대 사회의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학 12 홍유리: 앞의 분이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이 모두 신분을 형성하는 데 작용을 한다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현대에는 사회적인 면보다 경제적인 면이 신분을 성립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이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요즘에는 교육의 이와 같은 작용도 미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례토론회의 자료 중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말은 모두가 다 같이 못 살던 옛날에는 적용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출발점의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11 도문정: 현대 사회에서 신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는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1960 년대처럼 모두가 가난했을 시절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현재 경제가 발전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경제적 위치에 놓이게 되니까 소위 밑바닥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경제적 정책과 같은 사회의 시스템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합니다. 한 예로 보편적인 교육을 하면서 이전보다 교육적으로 지원을 폭 넓게 해 준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이 조금 더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경영 11 김서연: 저는 만약 현대사회에서도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사회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두 측면에 나누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직업에 따라 신분이 나뉘어진다고 생각하는 데요. 과거보다 직업의 귀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자본주의적 사상과 연결되어 화이트칼라 직업과 블루칼라 직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직업에 대한 의식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어져서 암묵적으로 임금이 더 높은 직업이 더 높은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신분의 사다리에 대한 얘기 중에 교육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높은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낮은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기 때문에 교육의 평준화를 통하여 신분을 상승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교육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점점 신분의 격차가 후에 심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11 김태연: 제가 현대사회에서 신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사회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으로는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일정하게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화된 문화를 누리는 측면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나와서도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월급으로 근근이 살아가며 평생 모아서 집 한 채를 살까 말까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 세대에서 돈을 축적해 놓은 집안의 자녀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로 보이는 회사원이더라도 막상 경제적으로는 신분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 11 송민영: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을 가려고 많은 이들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지능의 수준이 올라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위치의 불일치 현상이 계속되고 또 심화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학 12 홍유리: 한 예로 만약 민영씨와 제가 똑 같은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나 만약 민영씨는 집안 대대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졌다고 하면 그 동안 쌓아 놓았던 금전적인 우위뿐만

아니라 연줄을 이용하여 출세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대로 쌓인 부를 이용하여 더 좋은 교육을 자식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의무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질이 다른 교육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곳은 지금 한창 국제학교 열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학교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여 가보았는데 학교의 시설이 웬만한 대학보다 잘 되어 있고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 또한 잘 설비가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교과 외의 과정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그곳에 다니면 스펙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환경이었습니다. 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었는데 일년에 4000 만원 정도 들고, 고등학생의 경우 1 년에 5000 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총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을 12 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6 억에 가까운 돈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는 6 억에 해당하는 돈을 아이를 위해 투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고비용의 투자를 받고 자란 아이와 일반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의 교육의 질은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11 김서연: 이런 측면을 보면은 교육사업 또한 사람들의 신분상승을 원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치원과 같은 어린 때에는 공교육과 국제학교의 교육이 많은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괜히 교육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제 11 송민영: 공교육을 벗어나서 대학에 와서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위하여 대학생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인턴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회생활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이 인맥 중심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인맥을 이용하여 다른 경쟁자들보다 학점이나 능력면에서 우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 학년 때부터 LG 전자에서 인턴을 하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인턴에 떨어져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서 겨우 대외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의 67 차 월례토론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상승에 제한이 생기는 이유를 분석한 것이 과잉학력과 이에 따른 인력시장의 고급인력의 과잉공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대학의 입학정원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국제 11 도문정: 교육의 효율성을 늘리는 측면에서 입학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11 김서연: 전문학교를 늘리는 것을 찬성하지만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은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만드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11 도문정: 전문학교를 많이 만들고 활성화시켜 대학을 가지 않고 전문학교의 교육만을 통해서도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 11 송민영: 만약 특성화고등학교나 전문학교가 만들어진다면 그 곳에 가거나 자신의 자녀들을 보낼 생각이 있나요? 저소득층의 부모님이라도 자신이 못 다한 신분상승의 꿈을 자녀를 대학에 보냄으로써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고소득층의 부모님도 자신의 대를 물려받기 위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런 전문적인 고등학교가 많이 생겨나도 그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생겨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 11 도문정: 전문학교의 문제는 개인적인 선호보다도 사회적인 인식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전문학교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더라도 전문학교가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스위스 같은 곳은 대학에 가는 인구가 3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상고와 같은 교육기관이 낮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쪽으로 진학을 하여 자신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농공상에 대한 직업의 귀천의식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전문학교가 낮은 위치에 자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제 11 김태연: 싱가폴은 대학입학을 위해 재수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싱가폴의 유명한 총리인 리콴유가 재수에 대해 말하기를 만약 재수라는 제도가 있다면 이 나라에 청소부와 같은 직업은 누가 할 것이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리콴유가 90 년대까지 독재체제와 비슷하게 이런 제도를 유지하긴 했어도 싱가폴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직업의 배분이 잘 일어났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대나 상고를 다닌다고 하면 덜 배운 사람일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런 인식이 완화되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의 위치가 낮더라도 경제적으로라도 그 사람들의 일이 값어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측면으로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조금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제 11 송민영: 그렇다면 블루칼라 직종에도 임금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국제 11 김태연: 머리를 써야 하는 지식 위주의 산업이 아니더라도 스위스의 장인들이 그 업의 값어치를 인정받아서 높은 값으로 물건을 팔듯이 지금은 구체척인 방법이 생각나지 않지만, 블루칼라 산업에도 어떤 가치를 매겨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 11 송민영: 환경미화원 같이 고된 일을 하는 블루칼라 직종의 사람들의 복지만 향상시켜도 그 분들의 삶이 많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11 도문정: 블루칼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신분상승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 생깁니다.

국제 11 김태연: 모든 이가 신분상승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제 중학교 친구들 중 몇몇은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신분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사람은 아래 신분에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분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경영 11 김서연: 동의합니다. 농부의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분상승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도 신분 상승의 사다리에 대해 논의하는데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11 김태연: 제 친구 중 하나는 미국에 이민을 가서 목장에서 일을 하고 사는 것이 꿈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제 11 도문정: 저도 사실 농사를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태껏 배운 것과 투자한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은퇴 후로 미뤄두고 있습니다.

공학 12 홍유리: 다들 젊은이가 농사를 지으며 산다고 말할 때 제 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에 신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뭔가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11 도문정: 우리나라에만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인가요?

국제 11 송민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농장이나 농사를 짓는 땅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하층민이라는 인식은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농부들이나 농장주는 대부분 부농이고 주의 특색에 따라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제 11 김태연: 미국의 텍사스에서 소떼를 모는 농장주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문화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학 12 홍유리: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입신양명과 같은 말이 덕과 같이 여겨졌고, 과거도 의무적으로 집안을 세우기 위해 봐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요즘의 대학진학을 위한 열기와 농사를 하층민의 업으로 보는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11 송민영: 우리나라는 그럼 신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탈피할 수 없는 걸까요?

국제 11 김태연: 대학의 지역균형전형이 신분의 상승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분의 벽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국제 11 도문정: 그러나 그러한 제도마저 돈이 많은 지역의 세력가의 자녀를 밀어주는 등 비리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신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 11 송민영: 다시 전문대와 전문고, 그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가능할까요?

공학 12 홍유리: 제 친구 중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전문대에 진학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전문대에 가서 많이 놀랐다고 하는 데요. 사회의 전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학생들이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덜 배운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문대생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아예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친구는 그런 주위의 환경과 인식에 휘말려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11 송민영: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하루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대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전문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보다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에 고졸들을 더 많이 내놓기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대학졸업생을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궁금합니다.

국제 11 도문정: 전문대가 정부에 의해서 지원을 충분히 받는다면 전문대의 인식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문대가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 11 김서연: 만약 선린인터넷고등학교와 같이 전문고등학교를 가면 취업이 바로 되는 편인가요?

공학 12 홍유리: 주변의 친구 중에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 전문고등학교를 간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고등학교를 가서 특화된 기술을 배워도 몇몇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영 11 김서연: 예고와 같은 곳에서 미술이나 음악을 특화 해서 배우는 것과 흔히 말하는 전문고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문성이라면 둘 다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르치는 곳인데..

국제 11 송민영: 예고는 보통 돈이 많은 부모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라는 의식이 좀 더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용을 배우고, 악기를 다루는 학원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고에서 배우는 기술은 문화적으로 높은 계층에 속해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고에서 배우는 전문기술은 고평가되어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는 반면, 상고에서의 전문기술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 11 김서연: 제 친구의 남동생이 인터넷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어서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는 데 부모님께서 컴퓨터관련 직종에 종사를 하려 하더라도 일반고등학교에 다닌 후에 대학에 가서 하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남동생의 3 년을 버리는 것일 수도 있는 데요. 여기에서 아직도 전문고가 낮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제 11 송민영: 차세대 빌게이츠의 3 년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경영 11 김서연: 신분사회의 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유럽의 대학에서 학교의 순위가 없는 것과 같은 방식을 한국에서도 따르면 어떨까요?

국제 11 송민영: 여러분은 만약 후에 유럽 대학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 나라의 대학도 번호로 불리우고 순위를 없애자는 공약이 나왔을 때 지지하실 수 있습니까? 힘들게 노력해서 이대에 왔는데 후에 10 번 대학으로 불리게 된다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아무리 대학이 번호로 바뀌어 불린다고 해도 대학의 순위에 대한 인식이 전에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또 10 번 대학을 나온 사람은 사회에서 10 번 대학을 나온 사람을 끌어주려고 해서 쉽게 대학의 순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국제 11 도문정: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쉽게 대학의 순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질 것 같지 않네요.

국제 11 송민영: 오늘 신분과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대한 정의부터 전문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교육의 질의 불평등,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신분 상승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폭 넓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전공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다가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이 모여 사회에 대한 깊은 토론을 해보니 주어진 공부만 하는 고등학생에서 벗어나 정말 대학생이 된 것 같네요. 당장 신분의 벽을 허물 대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교육을 통하여 천천히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모두의 입장이 모아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현대사회의 신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첫 걸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⑨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지난 9 월 14 일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하에서 신분상승이 한국에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신분상승에 대한 월례토론회 영상을 보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유선미(신방과 3):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사 토론회에 사회자를 맡게 된 한국선진화포럼 10 기 홍보대사 유선미입니다. 먼저 이렇게 다양한 과에서 시간을 내주셔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67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에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정치외교 3): 시대가 변해서 요즘 세상은 돈이 없으면 공부도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은 극소수의 엄청난 노력을 제외하고는 아주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극소수의 일부가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뚫고 스스로 공부하기 좋은 명문대 진학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던 극소수의 학생은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으므로 연고주의에 또 다시 밀려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창희(국어교육 4):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집안형편이 넉넉한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진학 기준이 성적에 있는 만큼. 양질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성적 향상의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내용이나 방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노력 없는 양질의 서비스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강사는 자신의 수업 수준이 연봉을 좌우하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노력이 항상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백준우(군사학부 3): 2012 년 현재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사건사고가 보도 됩니다. 선생님이 더 이상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학생들은 언제부터인가 선생님 대신 '꼰대', '담탱이' 등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회초리 대신 수행평가 점수 기록표만 남아있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학교에 더 이상 선생님은 필요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점에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초중고교 시절을 보낸 20 대라면 흔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요. 명목뿐인 교원평가제 도입이 바로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유선미(신문방송과 3): 이점에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예슬(신문방송과 3):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에 몰락은 사교육의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예를 들자면 저와 같은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더 훨씬 좋은 성적을 갖고 있었지만, 집안사정이 매우 안 좋아서 대학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사정을 알게 된 지역단체에서 그 친구들 도와 주워서 일명 명문대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을 보자면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신분상승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형(법학과 3): 저도 극히 드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버지 세대만 보아도 '개천에서 용 났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는 많이 어려웠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하였고 그 중에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들만이 계층 이동 즉, 신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저희들은 정말로 간절한 것들이 있어도 곤히 잠들어 새벽 4 시에 깰 정도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분상승은 본인의 의지 차이라고 생각하며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아람(신문방송 4): 근데 우리 한국의 시스템은 조금은 기회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상승의 길은 교육과 노동의 기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노동에서 우리나라는 최고지만 기회에서는 최하위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빌게이츠와 스티브잡스는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서서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사를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스템에 문제로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선 사업, 창업에 실패하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잃고 한강을 찾아가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스템은 그들을 그렇게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관찰과 지원, 협력으로 그들은 다시 일어서 최고의 기업으로 탄생시켰고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을 고조 시켰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부터 잘 사는 사람들에겐 모든 혜택을 퍼주고 못사는 서민들에겐 빼앗아가는 착취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훈(소방행정 3): 기회의 균등만 주워진다면 우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부유계층에서 남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정책을 개편해야 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와 기업체 혹은 사적인 조직에서도 감시의 눈이 필요하며 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미(신문방송과 3):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훈(소방행정 3): 뭐..예를 들자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노동정책도 젊은이의 일자리 알선에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서계를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보균(신문방송 3):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신분상승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떠나서 연예인을 보게 된다면 신분상승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 가수가 자랄 때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어머니의 수술비가 없어서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성공을 하였고 어느 누구보다 더 잘사는 계층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신분상승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순영(군사학부 3): 그렇지만 돈이 많은 집안의 자제들은 금방 뜨기 쉽고 그만큼 금방 성공을 합니다. 뜨기 어려운 연예인은 심하게 말하자면 몸까지 팔아가면서 연예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게 과연 맞는 신분상승일까요?

최지혜(신문방송 3): 그런 부분은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지를 굳건히 한다고 해도 저 같은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다 연예인이 되는 게 아닌 것 처럼요…

유선미(신문방송과 3):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첫 시사토론회가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보안해서 다음 2 차 토론회 때 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모전을 준비하고, 학교 밖에서 추진되는 대외활동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참가비를 내가며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대학생들이 이와 같이 바쁘게 보내는 이유는 바로 훗날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성공'이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질까? 라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학생들은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사회에도 존재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윤보라(정치외교 09): 안녕하세요?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진행을 맡게 된 정치외교학과 09 학번 윤보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대화를 나누게 될 주제는 '한국사회에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며 사회에 나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할 주제인 것 같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사회에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각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오효주(정치외교 10): 우리나라에서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한 사람은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접근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수진(정치외교 10): 교육이 신분상승, 계층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피교육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상승은 교육의 수준, 혹은 교육자의 수준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느냐, 얼마나 계층이동에 대한 욕구가 있느냐에 따라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하미라(정치외교 10): 한국사회에서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한 두 사람과 조금 다른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21 세기 한국사회의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단순히 교육 하나로 결정된다기 보다는 개인의 재능, 여기에는 예술적 재능이라던가 그 외 다양한 것이 있겠죠. 그 재능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순히 교육만이 주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박슬기(정치외교 12): 저는 다른 분들과는 좀 반대되는 입장에 서있네요. 제가 볼 때 한국사회의 신분상승 사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기업도 2 세 경영을 시도하거나 혹은 2 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회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모세대가 지녔던 재산, 교육수준 심지어 문화예술 수준까지 이 모든 것이 자녀세대로 상속될 것이고, 결국 계층의 고착화와 양극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보라(정치외교 09): 네 각각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사회 내에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효주 학생부터 말씀해주세요.

■오효주(정치외교 10): 저는 계층에 있어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공교육이 우선이라고 해도 사교육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피교육자인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사교육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성공하는 사례가 존재하죠. 매해 수능이 끝나면 오로지 공교육만으로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드문 경우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사교육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며,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2009 년 기준으로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배용이 약 38 만원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비용이 부모의 소득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 하위 20% 가정의 경우, 사교육 지출비가 평균 약 4 만 2 천원 정도인 반면, 상위 20% 가정은 평균 약 33 만 2 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즉,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 수준이 정해지고, 그 결과 신분 고착화라는 문제가 생겨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분상승이 아예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이 신분상승의 방법 중 하나일 뿐, 유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사회구조가 이렇게 되었으므로 신분상승은 불가능하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그저 좋은 핑계거리라 생각합니다.

■윤보라(정치외교 09): 오효주 학생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신분상승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는 바로 교육, 특히나 사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고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그렇다고 아예 신분상승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오효주(정치외교 10): 그렇죠.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층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상승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오로지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진(정치외교 10): 저 역시 효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 경험을 비춰보았을 때 신분상승을 결정하는 것이 오로지 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 명의 학생에게 개인과외를 해주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 세 명의 학생은 모두 저를 통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명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세 명 모두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 학생의 성적을 보면, 같은 교육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상승의 차이가 존재더군요. 저는 이런 것을 통해 성적 상승은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고, 학생의 의지에 따라 성적 상승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특히나 사교육이 계층이동의 여부를 결정짓는 다는 것은 좀 잘못된 말이라 생각 됩니다. 꼭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개인의 의지만 있다면 신분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모든 것은 개인의 의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저는 한국사회가 부모의 소득수준이 곧 자녀의 소득을 결정하는 사회구조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싶지 않네요.

■윤보라(정치외교 09): 박수진 학생은 본인이 현재 과외를 해주고 있는 세 명의 학생을 실례로 들어 의견을 말해주셨습니다. 박수진 학생의 의견은 계층의 이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일 뿐, 부모세대의 소득수준이나 사회 구조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에 동의하나요?

■박슬기(정치외교 12): 저는 앞서 말한 두 분과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오효주 선배나, 박수진 선배가 말한 신분상승, 그러니깐 계층이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교육이 아닌 개인의 의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이해한 것 맞나요?

■윤보라(정치외교 09): 네, 오효주 학생은 신분상승을 하는데 있어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이었고, 박수진 학생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박슬기(정치외교 12):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신분상승, 그러니깐 계층간 이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사실 개인의 의지라기보다는, 개인 혹은 부모가 어떤 계층에 속해 있고, 또 얼만큼의 자본을 갖고 있는지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보라(정치외교 09): 박슬기 학생은 계층이동이 고착화되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에 맞추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박슬기(정치외교 12):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계층을 뛰어넘고자 24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쳐봐요. 그렇다면, 그사이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탱자탱자 놀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열심히 하루를 보냅니다. 우화 개미와 배짱이나,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측이지요. 차이가 있다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아무 지원 없이 맨몸으로 부딪치는 것이고,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지원을 받고 좀 더 편하고 수월한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즉, 시작부터가 다르고 주어진 환경이 다른데 개인의 의지가 무슨 소용일까 하는 의견입니다.

■윤보라(정치외교 09): 잘 들었습니다. 결국 Zero-base 에서 시작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와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시작하는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시작 선부터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시군요. 2012 년 2 월 20 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조사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액에 비해 8.11 배나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슬기 학생은 이처럼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큰 차이가 제공되느니 교육의 질의 차이를 가져오고, 교육수준의 양극화가 다시 소득수준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슬기(정치외교 12): 맞습니다. 단순히 교육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계속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윤보라(정치외교 09): 네 알겠습니다. 하미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미라(정치외교 10): 예전에는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신분상승의 수단 자체가 오로지 공부였잖아요? 고소득층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갔고, 결국에는 좋은 직업을 찾아 고소득층에 합류할 수 있었죠.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부모님들은 저희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야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는 공부만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요즘에는 공부가 아닌 다른 분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평범했던 20 살의 여대생이 옷을 좋아하고 평소에 옷을 센스 있게 잘 입었다는 이유로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는데 그게 성공해서 억대의 자산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화제가 된 양학선 선수도 자기의 재능을 살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명성을 얻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공부만이 아닌 재능을 보고 그 재능을 키워서 그 사람의 계층을 상승시킬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신분상승 수단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보라(정치외교 09): 미라 학생은 지금까지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공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여러 재능에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자로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오로지 재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일까요? 우스개 소리로 '예술을 하려거든 집안 기둥을 하나 뽑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체능 계열에서 공부를 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양학선 선수를 예로 드셨는데요, 양학선 선수의 집이 매우 가난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을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가난한 양학선 선수가 체조선수로서 세계무대에 설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한국의 대기업인 포스코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1985 년부터 체조종목에 후원을 해왔고 양학선 선수 역시 이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죠. 즉, 양학선 선수는 비록 부모의 후원을 받고 성장한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 존재했기에 가난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따지면 미라 학생이 말하는 '재능만으로도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오류를 갖는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미라(정치외교 10):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신흥귀족'들, 예를 들면 연예인, 쇼핑몰 CEO 등의 활약을 보면 개인이 가진 재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부정할 수 는 없죠. 지금도 많은 신흥귀족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오효주(정치외교 10):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처음에 제가 했던 의견과 조금 다른 의견을 말하고 싶어지네요. 저는 신분상승에 있어 개인이 속한 계층과 가정환경이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오직 그런 구조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미라의 의견에 반하는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사회 진출의 기회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질까요? 사회진출에 있어서는 또 다른 많은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보라(정치외교 09):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과,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사회진출의 벽을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가양과 나군 모두가 A+의 성적을 받았을지라도, 두 학생의 가정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회 진출의 수준이 나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공부를 잘 하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두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효주(정치외교 10): 또 한가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볼게요. 조사 중에 로스쿨과 사립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로스쿨의 경우 학비가 어마 어마 하다고 합니다. 과거 사법시험 제도였을 때에는 가난한 고시생이 사회 저명한 인사로 거듭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하지만,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그 학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로스쿨의 한 학기당 평균 등록금은 743 만원이고,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학비는 약 4400 만원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등록금 차이를 계산한다면 더 큰 액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학비가 가장 비싼 연세대 로스쿨은 3 년 등록금만 6000 만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 외에 추가적인 무언가를 하기에는 힘든 사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보라(정치외교 09):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의 평등은 주어진 사회이지만, 모두에게 동등한 높이의 사회 진출의 벽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박슬기(정치외교 12): 부의 대물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을 덧붙여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학능력에는 바로 영어가 있습니다. 다들 토익 공부 하시느라 바쁘시죠? 제가 본 기사가 바로 토익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부모님의 월 소득이 100 만원이 많으면, 그 소득이 100 만원이 더 많은 집의 자녀의 토익 점수는 그렇지 않은 집안의 자녀 점수보다 평균 21 점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 토익 점수가 100 점이 높은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연봉을 170 만원, 약 200 만원 정도를 더 높게 받는다고 합니다. 즉, 부모 소득의 차이가 자녀의 영어 점수의 차이로 이어지고 나아가 자녀의 소득 차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사회에서 부모의 계층에서 탈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의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수준에 따라 양극화되고 고착화된 구조의 변화 아닐까요?

■윤보라(정치외교 09): 토익 점수가 여러 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성신여대는 장학금 수혜 기준에 일정 토익 점수를 도입해, 2 학년은 600 점, 3 학년의 경우는 700 점, 4 학년의 경우는 800 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장학금을 주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만약 한 학생이 학교 우수한 학교 성적을 받았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토익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일정 토익 점수를 받지 못했다면 장학금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학생은 대학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나아가 계층이동의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오효주(정치외교 10): 그렇습니다. 장학금은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주는 것인데, 여기에 토익 수준까지 도입하는 것은 학교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는 부당한 처사 같습니다. 토익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료가 약 4 만원 저도 하는 것을 보면 결코 싼 가격도 아니고요.

■하미라(정치외교 10):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가 많이 발달되어있고, EBS, YBM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면 토익 기초수업은 무료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회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전되어 전반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무료 동영상 강의도 이러한 양극화 해소 방안의 일환이고요.

■박수진(정치외교 10): 맞습니다. 장학금 수혜 기준에 일정 토익 점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부당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죠. 또 한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친구의 추천으로 얼마 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급을 땄는데요, 이때 제가 공부한 것도 EBS 인터넷 강의 입니다. EBS 사이트에 가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강의가 있고, 또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제게 이 강의를 추천해준 친구가 저에게 요즘에는 공부에 대해서 만큼은 스스로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주었거든요. 그도 그러한 것이,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EBS 무료 동영상 강의와 같은 시스템이 얼마든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깐.. 진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보라(정치외교 09): 박슬기 학생은 앞서 말한 것과 연장선에서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에 대해 하미라 학생과 박수진 학생이 인터넷 무료강의를 예로 들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상황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문제 해결 시스템 두 가지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것 같네요.

한국사회에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계층 이동을 위해 행하는 노력은 개인적 수준의 것과 사회적 수준의 것으로 나뉘지만 둘 중 어느 한 가지 문제만 개선된다고 해서 사회 양극화와,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계층의 고착화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층 간 이동이 유동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발언해준 것처럼

개인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도 도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⑪ 청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우리나라의 사회양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처럼 간간히 계층상승을 한 예가 존재함에 따라 사람들 역시 그것이 사회 문제이기보다는 본인의 문제로써 치부하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층의 상승의 기회가 적어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이 되는 오늘날이다. 이에 대해 청주대 선진화 스터디 모임에서는 “신분상의 사다리, 한국에도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았다.



■이철우 : 과거 시골에서 서울 유명 법대, 의대에 들어갔다고 하면 온 마을이 잔치를 벌였던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법, 의대를 들어갔다는 것은 곧 성공을 의미했기 때문인데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나 역시 중산층 아니 상류층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핵심적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교육기회가 더욱 확대된 오늘날 오히려 과거보다 신분상승의 기회는 낮아지고 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안태식 : 과거 새마을 운동 등 경제개발 시기를 통해 신분상승을 이루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대기업 임원 분들은 대부분 이 시기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의 엄청난 노력도 있었지만, 시기적으로도 아주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신분상승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있더라도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안성모 : 저는 노력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살아도 항상 의지를 가지고 노력이 필요한데, 계속 “나는 안돼”,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등 항상 불평불만을 갖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양나영 : 저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은 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을 통해 본 문구가 하나 있는데, 요새는 “시집가면 개천에 빠진다” 라고 합니다. 일반 개인이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규영 : 사회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날은 과거보다 신분상승의 기회가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할까요? 상류층의 자녀와 일반가정의 자녀는 출발선부터 다르고 그것은 결국 대물림되고 계속 악순환될 것입니다.

■권예리 : 신분의 계층을 나눈 것은 자본주의로 인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변자민 : 저는 신분상승의 기회가 적어진 것은 맞지만, 그래도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성모씨와 의견이 같습니다.

■이철우 :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분상승의 기회가 적어졌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기회가 적어졌는지 나름대로 생각하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변자민 :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요. 중, 고등학교 학생 중 학교를 다니기 싫어 하는 비율이 40%라고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전혀 공부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틀에 박힌 교육 정책 그로 인해 개인의 자질을 펼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모 :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고등학교 야자, 예체능 과목의 비중 축소 등 무조건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맞추어 따라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공부해서 사회에 나온다고 해도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까요?

■권예리 : 저는 고용시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기업들은 아버지 세대들의 노력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데,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만 바쁩니다. 일자리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보단 고용률을 높이고, 비용이 덜 드는 비정규직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안태식 : 저도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학교 진학률이 82%로 2 위 미국 70%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로 1 등입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우리에게 존재한가요? 결국,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로 인해 학력 인플레를 낳았고 이는 잠재적 실업자를 양성 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철우 : 네. 각자가 생각하는 원인들이 모두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신분상승의 기회가 적어진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나영 :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서 만큼은 정부가 중심에서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확대를 방지하고, 비정규직이 존재하더라도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규영 : 공교육의 질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워낙 사교육이 발달해서, 공교육에 대한 질과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싸더라도 사설학원에 보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철우 : 올해 대선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 복지”와,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에 중점이 될 것입니다. 각 정당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공약과 실천방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공약들이 표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행동의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⑫ 경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지난 9 월 14 일, 경기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이 열렸는데요,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은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가?’ 라는 월례토론회의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신분상승’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중에 특히나 ‘교육 양극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열띤 토론의 현장을 한 번 들여다 볼까요?



정해경(국관 2) : 먼저 이 자리에 모여 줘서 고마워. 지난번에 나눠주었던 자료들 다 보고 왔지? 이번 달에 우리가 토론해야하는 주제는 바로 ‘신분상승의 사다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가?’라는 주제야.

신분의 차이, 계급의 차이는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당시에는 신분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 하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된

현재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신분상승'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나는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단적인 예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해. 교육의 양극화가 신분의, 계급의 양극화를 불러오게 된 것이지. 그렇다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이고, 현재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는지, 또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먼저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교육 양극화' 현상이 보여진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전원 보여진다고 말함)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일까? 수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고수진(국관 2) : 우선, 나는 이번 주제를 보고 며칠 전에 아버지가 한 말씀이 생각났어. 우리 언니랑 내가 다 경기대 학생인 것은 알지? 우리는 어차피 다니게 된 거 나름대로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 고등학생 때, 진짜 돈 백만원짜리 과외라도 시켰다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에이,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잘 다니고 있는걸요'라고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내 고등학교 친구 중에 잘사는 집 애는 그 때 300 만원이 넘는 과외를 받고 서울대를 갔거든. 물론 그게 과외 덕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기회는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윤현경(국관 2) : 맞아, 부모님의 경제상황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에는 동의해,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공교육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 우리 대입 때에도 수시에서 논술 같은 거 많이 보잖아. 근데 솔직히 그 논술에서 다루는 논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생이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싶어. 그 논제를 논할 수 있는 학생은 거기에 맞는 특수교육을 받은 아이들뿐인 거지. 결국 수시라는 문은 활짝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쇠를 가진자는 소수일 뿐이라는 거야.

정해경(국관 2) : 아, 나는 정시로 입학해서 잘 몰랐는데, 수시 논술문제가 많이 까다로웠나 보구나. '공교육의 부족'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큰 화제가 되었어. 가뜩이나 아이들 교육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교육이 사교육에 미치지 못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했겠어.



고수진(국관 2) : 맞아, 솔직히 공교육을 개선시키겠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정부가 제시한 공교육 방안 중에 눈에 띄는 것은 EBS 뿐이잖아. 하지만 아무리 EBS 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EBS 교재를 더 잘 가르치는 과외나 인강(인터넷 강의)이 생겨날 뿐이고,,,,, 정부가 시행한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박기현(국관 2) : 나도 현경이, 수진이 의견이랑 비슷해. 교육 양극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는데, 사교육의 대두가 교육의 양극화를 야기시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진 것인가? 우리 엄마 때도, 우리 할머니 때도 사교육 때문에 힘들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지금처럼 이렇게 과외 하나에 몇 백 만원 하는 것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사교육의 출현이 교육양극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교육이 왜 나왔는가 생각해보니까 공교육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출현한것 같아. 나는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데, 이과 선생님이 들어와서 그냥 애들 자습만 시키고 수업 안하고, 그럼 당연히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워야할 내용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고, 이걸 EBS 인강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잖아. 인강의 가장 큰 폐해가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교육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정해경(국관 2) : 그러니까 EBS 같은 공교육에 해당하는 것들이 사교육 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인거야?

박기현(국관 2) :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는 공교육은 EBS 달랑 하나잖아. 근데 이미 인강은 EBS 보다 훨씬 뛰어난 비타에듀나 메가스터디가 이미 장악하고 있고, 그나마 정부에서 밀어주는 EBS 도 사교육이 장악한 마당에 누가 방송만 많이 찾겠어? 솔직히 어쩔 수 없이 그 교재만 보는 거지, 강의는 안 듣고. 왜냐하면 수능에서 요구하는 건 과정이 아니라 답이니까. 또 수능도 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으로는 진짜 어떻게 이런 풀이가 나왔는지 조차도 알 수 없게, 우리가 12 년 동안 결석도 없이, 개근상까지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

고수진(국관 2) : 그런데 또, 그 이전의 문제를 보면 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질 수 있단 말이야, 결국은 개인의 가정환경으로 인해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

구은지(국관 2) : 맞는 말이야. 나도 교육양극화의 원인은 '부의 대물림'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해. 잘사는 계층의 사람들은 부유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그만큼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생각해. 반면 가난한 계층의 자녀들의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보다 모든 면에서 출반선부터 다르다고 생각을 해.

정해경(국관 2) : 모든 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데?

구은지(국관 2) : 뭐 교육환경이,, 학원이나 과외도 그렇고 일단 학교에서 받는 교육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 부유한 계층의 아이들은. 가난한 계층의 자녀들은 공교육만으로 해결을 해야 하니까. 경쟁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아예 출발선부터 뒤처지게 되었다는 것이지.

정해경(국관 2) : 그러니까 아예 출발선부터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이 다르다는 거구나. 아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김아영(국관 2) :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나는 교육양극화의 원인이 소득양극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식비를 제외한 잉여소득이 있으니까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공교육을 받는 애랑 그 잉여소득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아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리고 대학입시뿐만 아니고 대학에 와서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잖아. 그리고 거기에서도 잘사는 애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기 잘 다니고 잘 마칠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졸업 늦어지고, 취업 늦어지고, 그렇게 되다보면 사회생활 시작하는 시기도 당연히 늦어지고,,, 대학 진학후의 남은 인생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정해경(국관 2) : 그러면 소득양극화라는 것은 부모님의 경제력을 말하는 건가?

김아영(국관 2) : 그렇지,

정해경(국관 2) : 그럼 수진이 의견이랑 비슷한거네, 아리는 어떻게 생각해?

김아리(국관 2) : 나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아. 교육양극화의 원인 우리나라가 선택한 교육방법이 '경쟁'이라서, 우리사회가 선택한 방법이 '경쟁'이라서 양극화문제가 생긴 것 같아. '경쟁'을 하면 다 밟히게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누군가를 밟고 온거잖아. 그래서 내가 밟히지 않으려고 다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교육이 필요하게 된거지. 그런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협동'을 선택했잖아. 그런데도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환경이 많잖아.

정해경(국관 2) : 아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사회가 자본주의 안에서 경쟁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육의 양극화가 생겼다는 거야?

김아리(국관 2) : 그렇지, 나는 그림을 잘 할 수 있고, 얘는 수학을, 또 얘는 언어를 잘 할 수 있고 이런데, 우리사회에서는 모든 걸 다 요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쟁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

김지은(국관 2) : 난,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해. 돈 때문에 저소득층 고소득층으로 나뉘고, 사교육 받는 아이, 공교육받는 아이가 정해져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돈'이 모든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

정해경(국관 2) : 음,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소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공교육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거야?



고수진(국관 2) : 아니,, 그걸 짚어주고 싶었는데, 예전에 tvN 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왔던 프로그램에서 서울에서 어떤 단체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냐는 거지. 물론 저소득층아이들도 공교육 외의 기회도 있지만 그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 정말 몇 백만원씩 내고 받는 사교육보다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정부의 그 조그마한 지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한 애들이 얘기한 것이겠지?

정해경(국관 2) : 그렇구나.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한 교육양극화의 원인인데, 부모의 경제력차이, 공교육의 부족, 한국사회의 경쟁체제,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그 해결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지 이야기해볼까?

김아영(국관 2) : 일단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학문을 위한 것인지 졸업장 때문인 것인지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학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해.

정해경(국관 2) : 사회 분위기를 바꾸자. 한마디로 의식개선을 말하는 거지?

김아영(국관 2) : 그렇지.

구은지(국관 2) : 나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일단 공교육의 힘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 정부에서 사교육을 제한하는 제도와 같이 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결국에는 모든 교육제도를 다 뜯어 고쳐야겠지...

정해경(국관 2) : 그런데 그 사교육을 제한하는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과외를 금지하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몰래몰래 계속하고 그랬었잖아. 이러한 제도가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

고수진(국관 2) : 맞아, 예전에 10 시 이후에 학원 문을 닫게 했을 때도, 문은 닫아도 불도 꺼놓고 공부시키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법으로 안 된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정해경(국관 2) : 불까지 끄고 강의한다면 말 다한거네... 사교육을 없애는 것 말고 다른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김지은(국관 2) : 사교육을 없애는 걸로는 해소할 수 없고, 정부의 지원이 우선인 것 같아. 저소득층에게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정해경(국관 2) :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들은 급식비 같은 경우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가 말하는 것도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김지은(국관 2) : 아니지, 그런 기초적인 지원은 제외하고 교육에 따로 투자할 수 있는 여분의 지원을 말하는 거지.

박기현(국관 2) : 맞아, 먼저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는게 맞는 말이고, 일단 선생님들부터 바꿨으면 좋겠어. 나 고등학교 때 제일 나이 어린 선생님이 40 대였어. 다 정년퇴임 전 선생님들이고, 더 웃긴 건 거기가 사립 고등학교였는데, 최소 10 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 학교에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의 열의도 떨어지고, 교육과정은 계속 바뀌어 가는데, 솔직히 선생님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는 전문대학교, 실업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 미국 같은 경우는 college 나 university 똑같은 등급이라고 생각해. 물론 하버드나 예일대는 워낙 명문대니까 당연히 스카웃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취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야. 나는 제일 신기 했던 게 미국에 있을 때, '너는 꿈이 뭐야?'라고 했을 때. '나는 카센타 직원이 되는 게 꿈이야'라고 한 것이었거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너 공부 안 하면 카센타 가서 일이나 해야 된다'라고 엄청 비하하면서 얘기하잖아. 2 년제 학교를 가는 게 왜 잘못된 일이고, 공부 못하면 전문대나 간다는 식으로 말하는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



정해경(국관 2) : 맞는 이야기야, 우리나라에서 전문대와 4 년제 대학교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지. 지금까지 말한 방안이외에도 또 다른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부모님의 경제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개인의 노력으로 바꾼다든지, 자신에게 맞는 것을 특성화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교육의 양극화, 계층의 양극화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봤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같아. 올 겨울 뽑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알아줘야할 텐데...^^ 오늘 너무 고마웠고,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칠게!!

선진화 과제 25:

외국인이 바라본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제 82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공현덕(삼육대학교 경영학과)



다국적 기업이 선호하는 국가, 싱가포르

우리 나라의 경제 재도약을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07~2013 년 9 월까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64 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515 억 달러로, 한국의 해외투자액의 3 분의 1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제 82 차 월례로톤회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외국인 CEO 네 분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나카지마 토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를 문제점으로 꼽았고, 브래드 벅월터 ADT 코리아 사장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 코리아 사장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미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세르지오 호샤 GM 사장은 '노동 경쟁력 약화'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근로자들의 취약한 노동 경쟁력의 원인으로 노조 파업과 경직된 노동시장을 들어 주었습니다.

지난 3 년간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60 개국 중 22 위였지만, 노사관계 경쟁력은 60 개국 53 위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호샤 한국 GM 사장은 강성 노조로 인해 자신의 하루 일과 중 절반을 노사문제에 쏟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임금 인상률과 노동 생산성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지난 2008-2012 년 OECD 의 조사 결과 연평균 임금 인상률이 우리 나라 4.17%, 미국 1.37%, 일본 1.40%로 눈에 띄게 높았지만, 노동 생산성은 2013 년 The conference board 의 조사 결과 66,397 로 미국 114,930, 일본 76,741 에 비해 낮았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점점 올라가는데 비해 생산성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에서 조사한 노사관계 지수에서도 미국과 일본에 뒤쳐졌고, 2010 년 기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13 일로 미국 0.7, 일본 0.1 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11%에 불과한 노조가 호전적인 까닭에 노사문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이 문제입니다.



노조의 불법 파업

독일의 경우, 노소의 강성으로 인해 기업 경영 위기에 처하자, 정부 차원의 실업자 관리, 일자리 매칭 서비스, 직업 훈련, 해고제한 완화와 같은 '고용유연화'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노조의 과도한 힘을 약화시켜 노조가 기업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독일의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정책을 수용하고, 회사와 노조의 조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무려 7 년 간의 임금 동결을 감내하였습니다. 기업 측에서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노사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브래드 벅월터의 보안 전문 다국적기업인 ADT 가 한국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노사관계에 대한 관리의 노력이었습니다.

ADT 는 노사 간의 튼튼한 신뢰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DT 는 작년 한국 정부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임금 인상률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보다 비즈니스 전략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성공과 발전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롭습니다. 더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고 큰 자부심과 성취감을 얻어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기업의 손실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장이 망하게 된다면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사용자와 노동자는 동업자 의식을 가져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자와 노동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경쟁력 상승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임금 결정'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보너스 수당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는 생산성과 기업에 대한 신뢰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그것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국가 경쟁력을 통해 FDI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da5PlgDFV5k
http://www.youtube.com/watch?v=89ShkLseets

② 김민균(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먹는 것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아서?

만약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다국적 투자허브가 된다면 1 인당 소득 2 만 달러 초반에서 7 년째 멈춰 있는 한국경제도약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2007 년에서 지난해 9 월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액이 1564 억 달러이지만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3 분의 1 에 못 미치는 515 억 달러라는 결손을 메울 수 있을 것이며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의 다목적 효과까지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이 2 월 27 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 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연 월례토론회에서 4 명의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들은 몸소 겪은 고충들을 털어놓으며 국내의 열악한 기업 환경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내었습니다.

제 82 차 월례토론회에서 ADT Korea 사장 브래드 벅월터, 한국미쓰이물산 사장 나카지마 토오루, GM Korea 사장 세르지오 호샤, 솔베이 Korea 사장 안드레 노톰브 네 명의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들은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규제, 노사문제, 예측 가능성 없는 세무조사,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꼽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 효율성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뒤떨어진다는 점도 한국의 기업환경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었지요.

벨기에 화학업체인 솔베이의 안드레 노톰브 한국 대표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선 투자에 반하는 연구/개발(R&D)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기술 수출에 대해 소극적이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많은 분야의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는 길이 막혔다. 어떤 외국 R&D 회사가 이러한 환경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하였지요.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조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과 외국기업간의 제휴가 활성화되려면 중소기업 기술이 사장되거나 원청 대기업들에게 빼앗기는 현상을 막아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 내용처럼 기업하기에 힘든 환경 때문이지요. 싱가포르, 중국, 일본에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각각 4000 개, 516 개, 139 개 존재하고 있으나 8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FDI 유치에서 후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FDI 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까지 낼 수 있는 다목적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나요?

우리가 '삼시 세끼' 라는 것처럼 중요한 밥. 밥 한끼 먹는 데에도 역시 커피가격처럼 가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인 대학생들의 '백반' 가격 또한 6,000-7,000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가 대학생들에게 커피 한 잔, 밥 한끼 가격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마땅히 그 정도 값을 지불하고 먹고 마시고 하지요.

하지만 먹는 것 외의 것에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음악을 유료서비스로 이용하는데 5 천원 내외의 가격 (한 달 기준)을 아까워하거나, '영화는 공짜로 보아야 제 맛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솔직히 저도 위의 사례에서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잘 정립되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재형'이라는 음악가가 가난한 대학생 시절 프랑스로 유학을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보를 구입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문방구에서 복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때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젊은이, 이건 엄연한 범죄라네..'라고 한 일화가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찾는 것보다 인식을 바꿔야 할 때

프랑스라는 국가. 선진국의 국가에서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도 〈저작권 문제〉를 분명히 지키면서 당연시 여기는 현실인데 우리는 〈좋은게 좋은거지..〉라는 막연한 입장만 취해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온 것이지요.

여기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한국경제는 지금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난 7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9%를 기록하여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장기 경기침체 징후마저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를 뛰어넘을 재도약의 열쇠는 바로 국내 및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 활성화에 있지요.

하지만 그 열쇠를 써보지도 못할 상황이 지금 우리 눈 앞에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기업이 한국의 진출을 꺼리는 여러 이유들 중 하나,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한국 기업환경을 바라보았을 때의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지적재산권〉 문제라는 것이죠. 이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외국기업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어떤 것들이 실행 되어야 할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지적재산권〉문제는 지난 1990 년대 대한민국의 'copy cat' 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지만 아직 인식과 지난 오명을 벗기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오명으로 인해 해외의 수많은 기업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꺼리고 있는 현실이지요.

대한민국 = copy cat 이라는 오명 때문에 한국의 투자 매력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시민의식이 선진국다운 의식이 될 때 비로소 copy cat 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나라'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민의식의 선진화운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다른 법적인 제도보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식의 개선 즉, 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 대학생들부터 불법 제본 금지 운동, 음악/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지키기 운동(예를 들어 굿 다운로더 캠페인)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적재산권>으로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음은 피하자

이러한 선진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 스스로 <지적재산권>을 잘 보호할 때, 우리는 'copy cat'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로 한국의 기업투자는 매력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 과정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증가와 R&D 투자 증가로 우리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게 해 줄 제 2 의 경제성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의식의 선진화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적재산권>이 엄연한 <재산 즉, 자산>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하나쯤' 이 아닌 '나 부터'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사진 출처 :
사진 1 - http://youtu.be/UrGoYENVL1M
사진 2,3- http://youtu.be/SIahFd1_7CA

③ 김수현(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한국은 단시간에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국내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산업과 경제를 눈부시게 발전시킨,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떤가요? 한국은 2008 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연평균 2.9% 대의 낮은 성장률로 인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침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입니다. 글로벌한 스케일을 가진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것의 촉진제가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 촉진제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국내스케일이 아닌 글로벌스케일한 해결책, FDI 인 것입니다.

지난 2 월 27 일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 주최한 제 82 차 월례토론회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가 열렸습니다. 이날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CEO 4 인은 모두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브래드 벅월터 ADT 코리아 사장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문제점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카지마 토오루 한국미쓰이 물산 사장은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를, 세 번째로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르지오 호샤 GM 사장은 '지나친 법의 변경'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지나친 법의 변경이라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결정짓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문제인 예측가능성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 국내 투자에 대한 확신성을 갖지 못하고 투자를 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으신가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즐겨보는 편 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스포츠는 미리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스포츠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 규칙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과연 어떨까요?

아마 많은 선수들은 계속해서 바뀌는 규칙에 지치고 기운 빠져 할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팬들도 그 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식어버리겠죠. 팬들과 선수들 모두 소위 말하는 '정이 떨어진다'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의 규칙은 경기 중에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계속해서 경기 중에 규칙을 바꾸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있어 법이 너무도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뿐 아닌 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규칙이 바뀌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정권이 바뀔 때면 이전의 정권이 해왔던 일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철회하고 변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업이 장기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법이 바뀌는 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 중 법이 바뀌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또 투자를 계획 중인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문제점으로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20 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계획 할 때 있어 예측가능성이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법과 규제라면 과연 외국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유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선진국의 사례는 어떠한가요? 선진국인 미국은 한국 사회가 정권이 바뀌면 매번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많은 법들이 바뀌는 것과 다릅니다. 223 년전 조지 워싱턴이 초대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의 재무부를 비롯한 부처들은 정권의 변화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의 변화와 정부조직과 법은 독립적인 개체로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권 변화보다 한국의 정권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한국은 정권이 변할 때마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법안,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정부조직과 법의 개편의 이유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사회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잦은 정부조직과 법의 변경은 외국 투자자들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정권의 변화와 정부조직, 법의 개편은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과 법의 개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잦은 법의 변화로 인한 미래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법과 정부의 행정조직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의 해결책과 맞추어 Global Standard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한 세계에 맞추어 국내 시장에 외국 투자자와 외국 기업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화된 기준과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사회 환경에 맞추기 위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법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오히려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저해시키는 요인입니다. 법과 조직의 잦은 개편이 아닌 세계화된 시장에 맞는 국제 표준화된 정책과 정부조직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경기가 진행 중에 규칙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기업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자주 법이 바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성장요인이 들어오는 성장요인의 3 배가 되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FDI 의 유치는 꼭 필요합니다. 한국이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시장이 되고, 그 정책과 조직이 국제 표준화가 된다면 우리는 보다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④ 김희정(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기업환경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원탁토론회

21 세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시장은 더 이상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비용 대비, 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들은 전세계를 무대로 보다 나은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을 끌어오고 해당국가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2007 년에서 2013 년 9 월까지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15 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의 기업에 투자한 비용인 1,564 억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 투자될 수 있는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자본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입되는 자본이 줄어들고 있는 이 현상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로 이어집니다.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업이 성장을 해야 하는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률 또한 최고치인 60.2%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경제 성장을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많아지고 우리나라고 유입되는 자본은 계속 줄어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선진화포럼은 한국에 진출한 여러 외국기업의 최고경영진을 모시고 월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여러 국가의 CEO 들은 크게 4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벅 웰터 ADT 코리아 대표는 높은 임금인상률을 문제로 제기 했습니다. 임금인상 등의 문제는 시장기능에 맡겨져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솔베이코리아 사장, 안드레 노롬브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 강화되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카지마 토오루, 한국미쓰이 물산 사장은 정부의 번번한 세무조사와 감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자주 바뀌는 기업에 대한 법규가 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장기투자를 주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경영진들이 지적한 한국 기업환경의 문제점은 노사관계였습니다. 한국 GM 사장인 세르지오 호샤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지적했습니다.노사분규 문제는 대학생인 저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시청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제가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광경도 바로 노동조합이 시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임금인상, 복지개선 등을 외치며 농성을 벌이는 분들이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의 대다수였습니다. 계속되는 직업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 그리고 파업에 대한 결과물은 단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IMD 세계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지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쟁력은 60 개국 중 2012 년에 53 위, 2013 년에는 56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자본가를 유혹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저는 이 해결책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청광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시위

1950 년대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어떤 기반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에 있었습니다. 퇴근시간에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던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해외자본가들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저비용 국가에서 고비용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임금 인상을 위해 거리로 뛰쳐나오는 노동자들과 이로 인해 저조한 생산률을 기록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모습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점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의 자본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기업과 노조는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협력구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노조 관계의 협상을 보면 한 쪽이 이김으로써 그 끝을 맺고는 합니다. 이 때문에 끊임없이 협상을 위한 파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적은 같은 고객을 유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업과 노조를 보면 가끔 이 사실을 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툼은 쌍방향의 문제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업과 노사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개인이 아닌 단체의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대화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경영진은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함께 해준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을 공평하게 차등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노조는 단순히 임금인상, 복지개선을 외치기보다는 경영진을 도와 타 경쟁사보다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 나은 임금과 혜택은 기업이 발전한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ADT 캡스의 브래드 벅월터 CEO 의 경영방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브래드 벅월터 CEO 는 몇 천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과 노동자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CEO 에 대한 신뢰를 더욱 탄탄히 하고 이는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드는 시간, 금전적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결국 ADT 캡스는 내부의 문제가 아닌 타 기업들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결책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누르고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한 기업 내에서 경영진과 노동자들의 경쟁자는 서로가 아니라 바로 타 경쟁사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성장해나가고자 하는 노사관계는 기업에 더욱 큰 이윤을 가져올 것입니다. 서로의 갈등을 해결할 시간과 에너지를 경쟁력을 키우는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분위기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의 자본을 끌어올 것입니다.

이 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성장을 거듭할 것이고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입니다. 우리나라가 제 2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기업과 노조의 갈등 해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Wwrrbar5yMI
http://www.youtube.com/watch?v=NEH1HIwMLJw

⑤ 남아영(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현재 우리나라는 2008 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2.9%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장요인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3 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제 82 차 월례토론회에서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CEO 4 인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카지마 토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를 문제점으로 꼽으셨고 브래드 벅월터 ADT 코리아 사장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 코리아 사장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미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세르지오 호샤 GM 사장은 '노동

경쟁력 약화'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근로자들의 취약한 노동 경쟁력의 원인으로 노조 파업과 경직된 노동시장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노동 경쟁력 취약이라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인 노사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올바른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실례로 우리는 최근 여러 논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코레일 사태라고 칭해지는 대규모 노조의 파업이나 GM 코리아의 국내 생산 축소 문제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경한 한국 노조를 알게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여러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 통상임금 반환 소송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대된 것도 이에 한 몫을 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우리는 사회적인 여파를 몰고 오는 노조 문제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으로요.

노조 문제가 주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분명 생산성이라는 문제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생산성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합하였는가의 정도'를 지칭합니다. 물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방면이 논의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안은 '교육적 접근'이고 동시에 여성 및 노인의 재취업을 원활히하여 임금 대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능력 개발체제가 미비하다고 지적 받습니다. 노동시장의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근무자의 직무 관련 훈련 참가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평균인 37.1%에 뒤쳐지는 14.3%에 불과합니다.



교육 개혁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시도한 선진국들

이와 달리 선진국의 경우, 인적자원 개발과 고용 서비스 혁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을 통해 직업훈련시스템의 간소화와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지역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IT 기술과 더불어 기초교육의 강화 및 교육 인프라 개선에 크게 투자하기도 하였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영국 역시 '국가숙련혁신계획(21st Century Skills)'을 발효해 인적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인적자원 개발에 기반한 생산성 제고를 통해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특히 현재 동떨어진 직업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의 방향이 오로지 직업교육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재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기존의 대학교육과 더불어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방안을 토대로 생산가능인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생산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노사 문제 역시 지속적인 기업 내 교육을 통한 화합과 공생의 분위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대화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노사가 하나의 공동체이고 함께 윈-윈해야 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교육'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교육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경쟁력의 상승은 외국기업이 국내로 진출하도록 도우며 동시에 국내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나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2 만 5 천 불이 채 안 되는 현재 우리나라의 GDP 를 4 만 불로 진입하게 도우며 궁극적으로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지는 않을까요?

⑥ 배하연(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예측가능성 확보

2013 년 9 월까지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64 억이지만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515 억 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요인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3 배나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제 82 차 월례토론회에서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CEO 4 인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브래드 벅월터 ADT 코리아 사장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문제'를 언급한 반면, 나카지마 토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 코리아 사장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미한 것'을, 세르지오 호샤 GM 사장은 '노동 경쟁력 약화'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하기 전 유념해야 할 조건으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꼽습니다. 특히나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단연 '안정성'이겠지요. 때문에 초보투자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다소 안정적인 우량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성은 곧 예측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심스러운 시작에서 결과의 예측 가능성은 필수 고려 요건 중 하나이지요. 때문에 예측 가능한 투자처는 처음 투자를 하려는 자들에게 언제나 인기가 높습니다.

이는 개인의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국내 기업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20 년 이상의 장기 투자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외국 기업의 결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려 요소는 바로 예측가능성입니다.



급속도로 이루어진 한국의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제는 현재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 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력 3.5%에 크게 못 미치는 연평균 2%의 성장률을 보이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1982 년 공식 집계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고치인 60.2%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 재도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외국인직접투자(FD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한 예측가능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DT 코리아, 한국 미쓰이 물산의 CEO 등은 우리나라의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와 감사를 기업 경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한 세무조사와 감사를 겪고 있습니다. 법규의 적용이 지역별, 부처별로 다르고 업계 별로 빈도가 달라 특정 업계는 수년 간 지속적으로 감사 대상이 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적용 법규 역시 자주 바뀌어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번한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2013 년 11 월, 국세청은 올해부터 정기적, 수시적 기업 세무조사를 5000 억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3000 억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 년 2 월, 국세청은 예년과 달리 세무조사를 비정기조사를 줄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건수도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세무조사 기간도 10~30%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진행 도중 조사기간이나 범위를 확대하려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고무줄' 세무조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기에 예측가능성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을 우선 확실하게 의무화 해놓고 그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감사제도는 감사의 권한 행사뿐 아니라, 감사의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확정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비율이 전체 기업 중 1%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1.47%, 일본 4.67%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일본의 세무조사나 감사는 마약·테러 자금 같은 검은 돈을 추적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 역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일관성은 보장됩니다.



세무조사 제도를 확립하여 기업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싱가폴

싱가폴·홍콩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과다 납부를 지적하며 세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및 감사는 규제만 강화하고, 기업을 닦달하여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는 방해하는 저해요소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세무조사와 감사 분야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우선, 세무조사 및 감사 시행 절차를 표준화하고, 감사의 일관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감사제도는 그 법규가 빈번하게 변화하고 지역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등 기업 경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독일의 감사제도를 살펴보면, 관계법령이 지속적인 개정·보완을 겪고 있지만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업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 담당자들 사이에 절차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감사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담당자들이 보다 일관적인 감사 절차를 따르는가의 문제는 성과평가(BC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경우 성과 평가에서 세수 쪽 비중을 낮추고 얼마나 적정하게 과세했느냐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감사 담당자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

물론 현재, 기업 감사와 관련한 국내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기업 세무조사 기간을 5 일 이내로 단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 실시하는 등 친기업적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부담을 줄이는 세금납부 방법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외국 기업 CEO 들이 주장했던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 및 감사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측가능성은 투자를 부릅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고질적 문제인 노조문제 해결과 더불어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 및 감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 및 감사의 개선과 완화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기대합니다.

사진 2 - 한국경제 성장엔진(http://www.youtube.com/watch?v=flkLz32mQF4)

⑦ 서연우(고려대학교 국제학과)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는 노사

우리 나라는 연평균 2.9%의 낮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성장요인보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성장요인이 요인이 3 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제 82 차 월례토론회에서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총수 4 명이 같은 목소리로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카지마 토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비규칙적이고 잦은 재무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브래드 벅웰터 ADT 코리아 사장은 지나친 정부의 규제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또한,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 코리아 사장은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사권의 보호가 미약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르지오 호샤 GM 코리아 사장은 노사관계의 비효율성에 관하여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하루 중 절반을 노사문제에 투자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사관계의 비효율성은 무엇이 원인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현재 노동조합과 회사는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과도한 임금, 무리한 조건들을 회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복지, 야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미지급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들을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의 통로가 없습니다. 현재 노사들은 임금협상, 파업중단을 위한 협상자리에서 만날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로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노사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회사와 노동조합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노사는 공생해야 하는 관계

우선적으로 노동조합과 회사는 서로를 같이 공존하고 상생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 없이 근로자가 존재할 수 없고, 근로자 없이 회사가 운영될 수 없듯이, 서로가 같은 배를 탄 선원들이라는 인식을 지녀야 합니다.

폭력시위, 근거 없는 파업행위, 임금인상 회피 등은 서로에게 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회사는 비용이 증가하고, R&D, 직원복지, 임금인상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다른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글로벌화된 단일경제권에서 도태될 뿐입니다. 위와 같이 개선된 인식을 지녀야만, 노동조합과 회사가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노조가 상,하반기마다 경영진에게 건의해야 할 사항들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경영진은 그 건의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쌍방향의 소통이 노사 간에 이루어져야만 현재 부재하고 있는 신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의 인지, 노사 간의 소통의 통로가 생긴다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해외로 떠날려고 하는 국내 기업들은 한국에 머물려고 할 것이며, 해외로 이미 나가있는 국네 기업들도 많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성장요인보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성장요인이 많아짐으로써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저성장 문제, 청년실업 등을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1 인당 GDP 3 만불을 넘어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⑧ 송경남(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리공생의 노사관계

한국 경제는 지금 세계금융위기 이후 연평균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장기 경기침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고 성장률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내 및 외국 기업에 의한 투자활성화가 중요한 방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 년간 국내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의 3 분의 1 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제 8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4 명의 외국인 경영자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어보았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 강성 노동운동과 노조의 불법파업이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예측 가능성 없는 세무조사와 지적재산권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이사이기도 한 브래드 벅웰터 ADT 코리아 사장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활동해 투자를 늘리는데 자신감을 얻도록 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벅웰터 사장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 CEO 들이 논의하는 초점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욱 건전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일"이라면서 "여기에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기업들의 경쟁력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ADT 가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상을 수상한 것을 소개하면서 그 비결에 대해서도 "노사 간 신뢰를 확립한다면 사측은 임금 인상률 등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할 필요없이 비즈니스 전략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나카지마 토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외국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법령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였지만, 외국인 최고경영자들은 그 중 단연코 노사관계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외국인 최고경영자들 중 세르지오 호샤 GM 사장은 노사관계, 임금 문제에서의 비효율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노조가 전체 직원의 11%에 불과한데 너무 강성이라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일과 중 절반을 임금, 노사 문제에 쏟을 정도"라며 노사관계의 심각성을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핵심주제는 단연코 "노사관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어와 악어 새를 아시나요? 서로 다른 두 생물이 한 곳에서 이익을 주고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공생에는 쌍방이 모두 이익을 주고 받는 상리공생과 한쪽만 이익을 보는 편리공생이 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는 상리공생의 대표적인 관계입니다. 악어의 이빨 사이 고깃 조각을 먹고 살아간다는 악어새. 악어새는 악어로부터 식량을 얻고 악어는 이 작은 치과의를 통해 건강을 얻습니다.

만약 악어가 자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이빨 사이 음식물을 처리해주는 악어새를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어와 악어새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짐에 따라 상리공생은 편리공생의 관계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종업원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과 종업원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달리는 것으로 기업은 종업원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종업원은 기업의 이익으로 인한 임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과 종업원은 상리공생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상리공생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핵심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과 종업원의 관계를 보면 과연 상리공생관계인지, 서로간의 '신뢰'라는 것은 존재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리공생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디어 기업 '허핑턴 포스트' 입니다.

허핑턴 포스트의 창업자인 아리아나 허핑턴은 "직원들이 '오늘 하루만 견뎌보자 '는 식으로 출근하는 기업은 좋은 회사가 아니다"라며 "성공을 하려면 직원들과 교류속에 기업이 직원들의 스트레스까지도 관리해줄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직원들이 삶의 대한 경이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기업과 직원들의 교류속에 형성되는 신뢰를 강조하였습니다.

경영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사실상 파산했던 기업을 노사관계 회복을 통해 되살려 놓은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항공 JAL 입니다. JAL 은 경영회복을 위해 '이나모리 가스오 교세라 회장을 영입하였습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심각한 노사문제로 파산위기에 다다른 JAL 의 경영회복을 위해 제일 먼저 노사간의 신뢰 구축을 실시하여 경영목표를 '직원의 행복 추구'로 변경하면서 노사관계 신뢰회복의 시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리더들에게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기업구성원 모두가 경영자라는 '아메바 경영'을 도입하여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출 및 비용 성과를 알려주며 직원들에게 '이것은 나의 게임'이라는 동기부여를 심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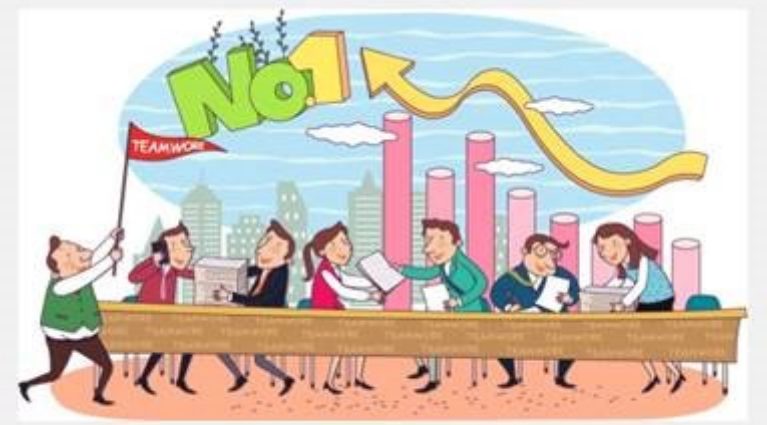
그리하여 이전의 회사의 수익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종업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노사 간의 신뢰 회복을 통해 파산위기에 처해 있던 JAL 은 영업이익 2000 억 엔을 달생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사 간의 신뢰는 기업의 존망을 좌지우지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기업과 종업원이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보고 달려간다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항공 JAL 의 사례 속에서 노사간 신뢰 회복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뉴스를 통해 기업 리더들의 공금횡령으로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노사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먼저, 기업 리더들이 종업원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종업원들을 가족구성원으로서 생각하며 양심 경영을 할 수 있는 정기적인 인성, 도덕 교육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업원들 또한 기업의 구성원, 그리고 공동체로서 자신의 노력이 기업의 수익으로 발전되며 기업의 수익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임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노력에 따른 충분한 임금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기업에게 유리한 수당 부분의 조정만이 아닌, 기본급의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하나의 팀, 기업과 종업원

기업과 종업원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팀입니다. 기업과 종업원 서로가 적이 아닌 팀이라는 개념으로 임금체계조정을 실시할 때 비로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편리공생관계가 아닌,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상리공생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노사관계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종업원이 악어와 악어새와 같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리공생관계를 형성하여 강성 파업과 같은 형태의 불만표출은 줄어들고 평화적으로 서로의 요구를 타협해가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한 노사관계 토양을 조성하게 되면 기업은 종업원 간의 튼튼한 신뢰를 통해 노사문제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 경영혁신에 몰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노사관계 외국인직접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 외국인 직접투자의 가장 큰 매력요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국내기업의 외국으로 유출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순투자가 활성화되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고, 선진경제 창조를 통해 제 2 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⑨ 이성문(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



대한민국은 현재 '저성장'이라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연평균 2.9%라는 낮은 경제성장률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침체 속에서 빠져 나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책을 내부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잇는 성장요인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직접투자인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입니다. 국외에 존재하는 무한한 자본을 투자금으로 끌어들여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자본보다 국내에서 국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3 배 이상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의 자본, 투자가 눈에 띌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2 월 27 일 열린 월례토론회는 이러한 원인을 현재 한국 경제환경에서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외국인 기업가 4 분이 각기 의견을 나누었는데, 한국 미쓰이물산 나카지마 토오루 사장은 예측불가능한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솔베이 코리아 안드레 노톰브 사장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의 취약, 한국 GM 사장 세르지오 효샤는 강성 노조 등 노동 경쟁력 약화, 마지막으로 ADT 코리아 브래드 벅웰터 사장은 지나치고 불필요한 규제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언급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국 투자자 혹은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복잡한 행정 규제와 불필요한 절차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많은 규제들이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 영역에서의 현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단순히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간접영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보다 눈여겨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잠재성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서비스 분야의 FDI 유치는 미미한 실적이며 현 상태로는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수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규제지수 0.16 으로 OECD 평균의 1.8 배나 되며, 규제가 높은 만큼 기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규제가 모든 현상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아시아의 4 마리 용이라고 같이 불렸다가 지금은 국민소득 5 만불을 상회하는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현재 서비스 영역에서의 대표적인 FDI 중 하나인 다국적 기업의 R&D 본부가 4000 여개 정도 있습니다. 8 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실정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뛰어넘어, 성장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지극히 '실용주의적 노선'을 추구합니다. 현장 실무에 강한 기술 관료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이를 인지하고 규제를 빨리빨리 바꿔왔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교육' 혹은 '선진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 규제로 인해 제대로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 허울뿐인 경제자유구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분야에서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완화 속도에 있어서도 실용주의적 노선을 취해 한국이 서비스 영역에서의 기업활동이 수월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물 안의 물이 말랐다면 다른 수원을 끌어와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한국 역시도 FDI 유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쇄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외국 자본의 투자를 억제시킬 위험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특히 규제완화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써 한 걸음 더 대한민국의 경제를 도약시킬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 1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i8ZwSfvW_gc

⑩ 이승창(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노사갈등

우리나라의 경제는 현재 7 년째 2.9%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투자가 저성장 문제의 해결책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국내로 유입되는 금액의 3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외국인 경영자로 하여금 투자를 꺼리게 하는 것일까요?

지난 2 월 한국선진화포럼은 4 명의 다국적기업 CEO 분들과 함께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며 직접 느낀 한국 기업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카지마 도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한국 세무조사의 예측 불가능함을 지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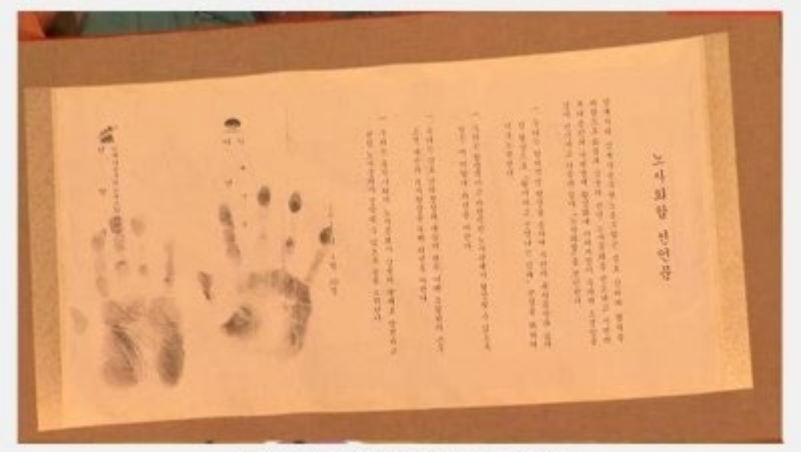
또한 화학업체인 솔베이의 안드레 노톰브 한국 대표는 투자에 반하는 연구·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세르지오 호샤 한국 GM 사장은 작년 60 개국 중 56 위로 거의 꼴찌 수준인 노사관계 경쟁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하며 강성노조로 인한 고충을 털어 놓았습니다.

노사갈등으로 나타나는 파업은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사 간의 깊은 갈등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크게 발전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업계에서의 노사갈등 또한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2 년에는 20 일간 파업으로 현대차의 경우 8 만 2088 대 생산 차질과 1 조 7048 억 원 매출 손실이 생겼습니다. 기아차도 생산 차질 6 만 2890 대, 매출 손실 1 조 348 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현대 • 기아차의 협력업체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현대 • 기아차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해외 공장을 더 가동시켜 대응했습니다. 체코, 미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등지에 잇따라 공장을 지으면서 노조의 특근 거부로 국내 생산에서 차질을 빚은 2013 년 상반기에는 해외 생산 비중이 54.3%로 더 높아졌습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국내 총생산과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강성 노조를 피해 해외에 공장을 늘려 결과적으로 자국 경제를 망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창조경제를 위해 필요한 노사화합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한국경제가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노사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대외적으로 표출되었을 경우 해결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갈등이 심해지기 이전에 조정하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 간의 단체교섭이 진행될 동안 제 3 자가 개입하여 교육하거나 지원할 여지가 별로 없는 환경입니다. 또한 단체교섭과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알선조정청(FMCS), 영국은 자문알선중채청(ACAS)를 두고 전국에서 수백 명의 조정관을 고용하여 상시 갈등해결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전문가의 지원과 함께 노조단체교섭이 이루어 지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노사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양식을 갖춘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고충처리기관으로서의 고충처리위원회를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근로자의 애로 및 갈등을 상담하게 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더 큰 갈등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사가 노동자를 아끼고 책임지며 노동자 역시 회사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결국 노동자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내부화합이 이루어 지지 않고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은 성공적일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투자하고 싶은 나라는 생산성이 높고 우수한 인재가 많은 나라일 것입니다.

원만한 노사문제해결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하나되어 나아가는 기업문화가 필요합니다.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은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을 구해내고 국민소득 3 만 불의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XkW3kBki3Wc
http://www.youtube.com/watch?v=WiNBQPaSUfM

⑪ 정원석(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준 제 82차 윌레트론회

한국경제는 지난 세계 경제위기 이후 연평균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3.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점점 늘어나고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제조업의 성장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내부 성장요인이 고갈되어 가는 현재 외부성장요인을 끌어들이면서 경제성장을 기대해 보아야 합니다. 외부성장요인에는 자유무역협정(FTA)와 외국인 직접투자(FDI)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FDI 를 유치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 년 2 월 27 일 열린 제 82 차 월례토론회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 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최고경영자 4 명이 한국의 열악한 기업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국인 CEO 가 바라보는 한국의 기업환경의 문제점은 크게 3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CEO 들은 각종 세금과 관세에 관한 규제의 잦은 변경, 노사관계의 비효율성 및 임금문제, 많은 규제들로 인하여 제한 받는 기업환경 등을 한국 기업환경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 벅웰터 ADT 코리아 사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 CEO 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은데 "기업 규제 완화와 건전한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활동해 투자를 늘리는 데 자신감을 얻게 하고 창조적인 결과물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들에게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도 다보스 포럼 회의에서 발표한 것처럼 규제로 인한 장애물들을 철폐하는데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전부터 규제완화와 철폐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 분야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익집단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해당 지역의 이익을 위해 법을 재정하기도 하고 재계의 인사들이 압박을 넣어 규제의 완화를 막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뜨거운 문제 중 하나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문제도 규제완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규제로 묶여있던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여기에 외부자본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러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규제완화에 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전공의

이번 규제완화에서도 대한의사협회에서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 일에는 전공의들이 나서서 단체 휴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규제완화의 위험성을 생각하여 반대를 하는 전공의들의 생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험성을 안고서 규제완화를 진행하였을 경우에 결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를 예로 들면 한-미 FTA 로 인한 스크린쿼터제도의 축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제도가 완화된 이후 한층 더 성장한 한국영화

스크린쿼터제도 축소가 처음 의견이 나오고 진행될 때에는 영화배우나 영화감독 등 영화 관계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할 만큼 한국 영화 산업이 망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이후 지속적인 개방을 통해 외국영화와 경쟁을 하였고 아시아 영화 시장에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의료산업은 내수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 지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이나 병원경영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해외로 수출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조직 형태 및 사업범위가 넓어지면서 보건, 의료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예시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촉진,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등 많은 부분에서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통해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TjvWJh3NQdQ
http://www.youtube.com/watch?v=a8QqYITSxms

⑫ 주연아(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생인 제 주변에는 올해 4 학년이 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만큼 취업준비에 한창 바쁠 시기인 친구들에게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휴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대답을 자주 듣곤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것을 우려하여 졸업을 서두르기보다 학생신분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가 하면,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요인으로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의 규모는 한국이 외국에 투자하는 것의 3 분의 1 수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우리나라 성장요인의 무려 3 배에 달하는 규모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인 셈이지요.

이렇듯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니 위해 선진화포럼에서는 지난 2 월 27 일,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ADT 코리아 사장이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 브래드 벅웰터 사장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즉,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투자를 늘리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 GM 사장은 취약한 노사관계로 인한 잦은 노사분규, 그리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근로손실 일수를 제시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노동 경쟁력 재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미쓰이 물산 사장인 나카지마 토오루씨는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은 어려움 중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를 지적하였는데요.

기업이 장기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시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예측가능성인 만큼 세무조사 또한 일관성있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밖에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당장 우리나라가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기업하기 좋은'환경을 조성해 주려면 어떤 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까요? 바로 '노사관계 개선'일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노사 간의 갈등을 인해 기업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IMD 세계 경쟁력 센터에 따르면 2010 년 기준으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미국 0.7, 일 본 0.1 일인데 반해 한국은 무려 13.2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환경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노사관계 개선

즉, 정상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었던 13 일 노동분 만큼의 가치를 날려버리고 만 것이지요. 근로자와 회사간의 갈등의 대표적 원인은 '임금인상 요구'일 것입니다.

근로자 측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임금인상을 회사와의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파업을 강행하기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 월초의 이슈가 되었던 철도파업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타협보다는 생떼쓰기 식의 요구만으로는 결국 떼쓰는 쪽조차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노사 양측 모두 '운명공동체'에 속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업내에서 노사 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50 년 간 노사 간 협력관계를 유지한 모범적 사례를 보이는 도요차 자동차의 예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요차 자동차가 노사 간 관계를 설명할 때 비유하는 것이 '한축의 두바퀴'입니다. 즉, 한축에 매달린 두 바퀴는 다른 한쪽의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 결국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두바퀴가 동시에, 즉 노사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정기적으로 회사측 대표인 관리자와 노조 측 대표가 각자 상대방의 일터를 방문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자리를 가지면서 상대방의 불만사항 또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도요타의 예와 같이 노사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길 바라는 것과 같이 상대방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의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력이 필요하듯이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도 노동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회사와 노동자가 '운명공동체' 정신을 공유하며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처럼 노사가 서로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외국직접투자 증가를 통해 한국의 성장동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겠지요?

⑬ 김예진(배재대학교 바이오·의생명공학과)



한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낮은 투자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 8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대표 다국적 기업 CEO 네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ADT 코리아의 브래드 벅웰터 사장은 ADT 코리아가 한국의 보안 부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을 건실한 규제 완화 조성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미쓰이물산의 나카지마 토오루 사장은 무역 절차의 간소화와 외환거래 절차 규제 완화를, 한국 GM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Win-win 할 수 있는 노사관계 형성을 주요한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그 중 저는 솔베이코리아의 안드레 노톰브 사장이 주장한 'R&D 센터 유치를 위한 전략 세우기'에 대해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과 개발로 공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한 연구 개발과 창조적은 활동은 전문 용어로 Research and Development, R&D 라고 불립니다. 특히 창조경제의 실현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된 만큼,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R&D 센터를 유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선도형 R&D 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국가 R&D 사업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R&D 사업과 R&D 센터 육성은 경제 성장에 큰 열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R&D 센터 유치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의 '핫 이슈'로 여겨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교훈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R&D 센터를 육성하여 연구개발을 늘리게 되면 우선 우리나라 기업과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의 연결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R&D 는 단순한 상품의 수입이나 판매를 넘어서 전반적인 기업환경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현재 국내에 둥지를 큰 외국기업의 덩치가 날로 커지고 있고 1 조원 매출을 넘기는 이른바 '1 조원 클럽'에 속한 외국계기업이 20 개에 달하는 만큼 그들은 한국 경제의 큰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계 기업 55%가 정책 일관성 부족, 경제적 변수 등으로 한국의 투자환경이 다소 열악하다고 평가한 만큼, 외국계 기업 R&D 센터 유치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R&D 센터의 외국인 기술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해결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R&D 센터 육성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간다면, 외국인 투자자 수를 점차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방안으로 직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또한 R&D 센터는 '아이디어 상호 교류의 장' 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FDI 가 신규 R&D 센터를 구축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닌, 기존 국내 R&D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이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R&D 센터를 설립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정부와 FDI 를 받는 대기업과 함께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FDI 를 유치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외국계 기업에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R&D 센터의 유치는 단순히 개발을 위한 공간을 건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중요한 요인인 FDI 의 증대, 더 나아가 창조경제의 실현에 있어 발판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만큼 단기간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국가는 없습니다. 이제 과거 '한강의 기적' 을 다시 한 번 이루어 낼 시기가 왔습니다. R&D 센터의 육성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 '제 2 의 한강의 기적' 을 위한 획기적인 열쇠입니다.

그림 1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gUZYOFunK3k

⑭ 김유라(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현재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를 하게 된다면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기업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난 2014 년 2 월 27 일, 저는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 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 82 차 월례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각 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를 맡고 계신 4 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벅 월터 ADT 코리아 사장은 임금문제가 기업경영에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임금은 지난 5 년 간 연평균 4.2%나 올랐는데,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인 나카지마 토오루는 한국 기업의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를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기업이 장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예측 가능성에 있는 만큼, 감사 시행 절차의 표준화나 일관성, 담당자들 사이에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투자 기업이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법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샤 한국 GM 사장은 노사관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잦은 파업으로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60 개국 가운데 56 위에 그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사관계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 월 23 일에 저는 부산으로 놀러가기 위해 친구와 한 달 전부터 KTX 표를 사놨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5 일 전, 코레일로부터 갑작스런 문자가 왔었습니다.



촛불 시위를 통한 철도 파업

철도 파업으로 인해 제가 타려던 기차가 사라졌으니 다른 기차를 이용해 달라는 문자였습니다. 친구와 처음 놀러 가는 부산이기에 들뜬 마음과 신나는 기분이 한 순간 불안과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난생 처음, 기차표를 예매했기 때문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코레일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당장 환불이 되는 것과 다른 기차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소를 하면 3 일 정도의 소요시간이 있어야 환불요금이 들어오고, 다른 시간대 혹은 다른 기차를 찾아서 제가 다시 예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 할 수 있을지 코레일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뉴스를 보면 출근하는 사람들 혹은 고향에 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철도 파업으로 인해 상당히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 기업의 노사관계의 악화는 파업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지난 12 월 30 일, 최장 기간인 22 일 동안의 철도 노조 파업이 드디어 철회되었습니다. 2013 년 12 월 30 일,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키로 전격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총 손실은 47 억을 넘었으며, 이중 화물분야 손실액은 26 억, 여객분야 7 억 그리고 투입비용 14 억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겪은 불편과 철도운송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여러 중소사업체들의 국가이미지 재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은 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독일, 스페인 그리고 일본 등 여느 다른 나라와 한국의 임금인상, 노동생산성 그리고 노사관계를 비교해 보면 임금인상은 4.17%로 한국이 가장 높았고, 노동 생산성과 노사관계는 각각 66397 과 4.21 로 가장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7 년 이후에는 노사관계와 수익성 간의 관계가 점차 커졌다고 합니다. 노사관계가 불안한 장수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최근 20 년 간 3.5%에 머문 반면, 노사관계가 안정된 기업들은 9.2%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파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업에 대한 확실한 제도가 있기에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도요타'는 장수기업 중의 하나로서 확실한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의 노사관계의 특징으로는 종신고용제도, 노사 간의 임금 협상제도와 종횡사선으로 연결된 유대관리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종신고용 제도를 통해서 품질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어 막대한 이익 창출과 효과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최고 경영층이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임원진도 솔선 수범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92 년부터는 임원 평균 임금을 근로자 평균 임금의 3 배 수준으로 동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종업원과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나누는 장을 마련하여 도요타 내에는 '인포멀그룹'이라 불리는 친목회가 조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의 노사안정의 성공요인으로는 크게 고용 안정 정책,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있습니다.

도요타는 1950 년 이후 현재까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연공서열을 유지하면서도 성과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현장의 고충을 처리하고, 열린 의사소통을 권장하였다고 합니다.



노사 관계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기업에 대한 생산성과 이미지도 상승할뿐더러 한국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사관계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파트너 십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경쟁해야 할 기업도 많은데 자신이 다니는 회사 안에서는 서로 분열 없이 경쟁력과 배려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용력 있는 파트너 십을 갖고 협력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도 해결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1) http://www.youtube.com/watch?v=2fXNWcoRPjw

사진출처 2) http://www.youtube.com/watch?v=Gui_ScsKWl0

⑮ 김현경(군산대학교 해양학과)



한국 경제는 세계금융위기(IMF) 이후 지난 7 년 간 2.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함으로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장기 경기침체 징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회복기조로 들어서는 올 해지만, 한국경제는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고 성장률을 높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유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FDI 유치를 촉진한다면 저성장의 늪을 탈피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떻게 FDI 유치를 촉진시켜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최근 5 년 간(2007 년~2013 년) 외국에 투자한 금액은 1,564 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반대로 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515 억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GDP 대비 낮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1/3 만 외국기업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을 맞이하여 한국 선진화 포럼은 제 82 차 월례토론회를 진행하며 '외국기업이 바라본 한국기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CEO 분들의 의견을 통해 FDI 유치 방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총수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한국에서는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답하였고, 이는 원활하고 생기 있는 상호협력의 노사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르지오 호샤(한국 GM 사장)는 '노사간의 이해조정'을 언급하시며 특히나 국가 노동 경쟁력은 60 개국 중 22 위에 있지만, 노사관계 경쟁력은 56 위라는 자료를 통해 한국의 노동 현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나카지마 토우로(한국미쓰이물산 사장)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안드레 노톰브(솔베이코리아 사장)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시며, 협력에 대한 창조적인 융합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래드 벅월터(ADT 코리아)는 정부개입이 종전보다 축소되고, 자유로운 경쟁, 공급과 수요에 기반한 기업환경을 통해 규제적으로 신경쓸 부분이 줄어들면서 노사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고, 임금 때문에 일어나던 노사분쟁을 줄이며 오히려 튼튼한 신뢰를 확립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ADT 의 사례를 통해 통상임금과 노사에 대한 강한 규제보다는 서로의 협력과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자체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국가 노사관계 경쟁력이 56 위에 위치해 있지만, 많은 외국기업들은 낙관적인 경제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 노동 경쟁력이 60 개국 중 22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노사관계가 호의적인 태도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 재도약의 열쇠는 한국내 투자율을 높이며,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사의 관계가 호의적이고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이 구축된다면, 강성노조도 약화되며 외국으로 이전한 기업들의 회순과 FDI 의 유치도 증가할 것입니다

외국이 기대하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노사의 협력이 만들어낸 신뢰를 바탕으로 재도약의 열쇠인 FDI 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⑯ 심성보(공주대학교 공업화학전공학과)



얼마 전 한국선진화포럼의 제 82 차 월례 토론회에서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충영 KOTRA 옴부즈만의 사회아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유명 외국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하여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제의 배경은 '우리나라는 지난 7 년 간 연평균성장률이 2.9%를 기록하여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과 세계 경제가 조심스러운 회복기조로 들어서는 올 해 우리나라가 경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열쇠는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활성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 GM 사장은 한국의 노동 경쟁력 약화를 문제로 꼽으면서 특히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등을 언급했고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외국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법령 폐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카지마 토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를 문제점으로 언급했으며 저는 브래드 벅월터 ADT 코리아 사장의 주장을 가장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외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 중 ADT 코리아의 브래드 벅월터 사장은 'ADT 코리아가 한국의 보안 부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건실한 규제 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보안부분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장애물이 상당히 제거되어서 ADT 는 전략적이고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정부가 정부 개입을 줄이고, 자유 경쟁, 공급과 수요에 기반한 보다 더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활동하여 투자를 늘리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근혜대통령은 '경제혁신 3 개년 계획'의 첫 번째 계획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외국인투자가 제조업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연구·개발센터' 등 고부가가치 시설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들여다 보면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확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래드 벅월터 사장이 말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뚜렷한 정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잘 이루어져서 4,000 여개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가 있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취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 돼있고 외국자본을 자국의 자본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정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1978 년부터 외환시장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져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 외국인 투자가의 과실 송금은 물론 배당금, 이자, 로열티, 서비스 수수료도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요건은 최소 자본금 1 불, 현지거주 이사 1 인 등으로 최소화 되어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고, 허가를 요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1 일이 소요되며,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도 2~4 주 경이 소요되는 등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요하는 업종이 매우 제한적이며 외국기업에게 제한되는 업종 또한 방위산업, 방송산업 등에 국한되는 등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위한 친 비즈니스 정책을 세워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고유기능과 기간산업 보호 등을 위해 공공행정·외무·국방·입법 및 사법기관·교육 등 60 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불허하는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식량·원자력·항공운송·방송 등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지만 투자지분에 제한을 두는 '제한업종'으로 일률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절차에는 내국인에 비해 신고-투자자금 송금-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의 단계가 추가됩니다.

벤처 분야에서 싱가포르는 에너지, 석유화학, 물류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글로벌 트레이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트레이더로 인정받을 경우 법인세율이 17%에서 5~10%로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며 과학 연구·개발 육성을 위해 160 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벤처 육성 정책 가운데 하나로 2010 년 시작한 '기술 인큐베이팅 계획(TIS)'은 정부가 벤처기업 설립과 성장을 위해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TIS 프로그램에 뽑힌 벤처 기업은 필요자금의 85%를 최대 50 만싱가로프달러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15%만 자체 조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3 년 뒤에는 정부가 가진 지분 85%를 살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싱가포르는 지속적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열악한 기업 환경 속에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업을 규제하는 입법을 통해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한 60 개 업종을 파악해서 제조업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편향된 산업을 변화시켜야 하고 내국인에 비해 복잡한 외국인의 투자 절차를 간소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TIS 프로그램같은 한국형 벤처 육성 정책으로 벤치마킹해서 글로벌기업의 헤드쿼터 및 연구·개발센터 등 고부가가치 시설을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⑰ 장윤석(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한민국은 현재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으로 들어오는 성장요인보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성장요인이 3 배가 많습니다. 외국기업 CEO 들은 대한민국에 투자하기를 꺼려합니다.

이에 제 82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주제로 외국기업 CEO 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브래드 벅웰터(ADT 코리아 사장)는 “노사 간 신뢰를 확립한다면 사측은 임금 인상률 등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할 필요없이 비즈니스 전략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노사관계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 GM 사장)는 한국의 노동 경쟁력 약화를 문제로 꼽으면서 특히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카지마 토우로 (한국미쓰이물산 사장)는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의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는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외국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법령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외국기업 CEO 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중 노사관계의 문제를 신뢰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한 브래드 벅웰터(ADT 코리아 사장)의 주장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노사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기업 CEO 들은 노사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에 투자하기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현재 TV 를 시청하거나, 인터넷을 하다 보면 철도파업, 현대자동차파업 등 노사관계에 대한 기사를 1 년에 수십 번씩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 12 월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차역에 갔을 때 노조파업으로 인해 원하는 기차 시간대를 이용하지 못 한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른 시간대의 기차를 이용하였습니다. 기차를 이용하면서 같이 탄 승객들의 입에서는 파업이 언제 끝날까? 라는 말을 한 마디씩 내뱉었습니다.

작년에 저에게 철도 파업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버스 파업도 있었죠. 학교를 마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파업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조파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오는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날짜에 월급을 못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내가 여기서 일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손님들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에서 대기업까지 노사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관계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보니 지난 3 년 간 60 개국 중 대한민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56 위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미국의 0.7 일과 일본의 0.1 일에 비해 한국은 13.2 일을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사관계의 경쟁력이 뒤쳐지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아진 결과 외국기업의 대한민국 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노사관계, 신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사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답은 신뢰입니다.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적인 관계가 되려면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과제가 필요합니다. 경영계는 최고경영자의 노사관계관과, 투명경영, 성과의 공정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계는 파업을 최후 수단으로 인식해야 하고, 경영에 대한 이해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의 노사관계관의 성공적인 사례로 ADT 보안회사의 브래드 벅웰터(ADT 코리아 사장)은 노사관계관이 “직접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는 경영”이었습니다. 브래드 벅웰터(ADT 코리아 사장)은 노조위원장이라 생각이 들만큼 노동자들에게 많이 다가가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와 CEO 간의 신뢰가 쌓이고 성공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투명경영을 통해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벽을 없애 노동자들이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이 투명하지 않으면 사원들도 기업에 대해 믿지 못하고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성과의 공정분배는 서열제 보다는 성과제를 택하자는 것입니다. 서열이 높다고 해서 낮은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분배에서 차이를 둔다면 낮은 직급의 사원은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노동계 또한 파업을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파업을 하기 전 그에 대한 타격을 생각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또한 경영에 대한 이해능력을 향상시켜 경영자와 노동자가 서로 발전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과제를 풀고 신뢰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서로가 Win-Win 하는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이에 외국기업의 CEO 들의 인식도 바뀌게 되면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외국 기업들의 대한민국 투자로 인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성장요인도 잡으면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⑱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일까?

부진한 경제성장과 고용악화 속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 및 고용 활동을 벌이고 세금을 내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은 국적만 다를 뿐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6%,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FDI 의 양과 질을 높여 우리 기업에 의한 해외투자와 국내로 유입되는 FDI 사이의 간극을 메워 나갈 수 있다면,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외국인 직접 투자의 현실은 어떨까요?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가 싱가포르에 4000 여 개, 중국에 516 개, 일본에 139 개나 있는 반면 한국엔 고작 8 개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관하여 한국선진화포럼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리더로서 한국 현장에서 직접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CEO 들을 패널로 모시고 한국의 기업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을 최종 투자지로 꺼리는 주요한 이유로 1. 한국의 강성노조 2. 고임금 3.과도한 행정규제 4. 일관성 없는 기업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외투기업의 CEO 들은 임금협상을 목적으로 한 강성노동운동과 불법파업이 노사문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한국
임금 변화율	1.37 %	3.10 %	2.47 %	-1.92 %	1.40 %	**4.17 %**
노동 생산성 (USD)	114,930	79,848	82,766	78,805	76,741	**66,397**

한국의 임금 변화율과 노동생산성의 불균형

세르지오 호샤 한국 GM 사장은 한국 노동 비효율성의 근거로 임금 인상률과 노동 생산성의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고용인구 1 인당 노동 생산성은 66,397 달러로 제일 낮은 데에 비해 연평균 임금 인상률은 4.17%로 가장 높습니다.

생산성에 비해 임금 인상률이 높다면 이는 당연히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네거티브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가장 지역본부를 두고 싶어하는 나라로 꼽히는 싱가포르에서는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싱가포르에서는 1972 년부터 국가가 임금 인상에 직접 개입하는 '국가임금위원회'를 설치하여 임금 인상이 생산성을 절대 앞지를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은 거의 무노조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획일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근로기준과는 상관없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추가 지급은 유효하지만 회사의 재무 상태에 과다한 부담을 줄 때, 그리고 노사가 이미 합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추가 임금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더 많은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강경한 노사대결의 구도 내에서 노사간 단체임금협상이 이루어 졌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로 '성과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시급하게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노사가 상호 신뢰하면서 합리적인 임금협상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외투기업들의 투자 축소를 막고, 나아가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임금 관리를 통해 안정적 노사관계가 뿌리내린다면 한국은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하고 싶어하는 유망한 투자처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⑲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한국이 대기업의 수출중심 경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제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세계화 덕분에 금융부문이 개방되면서 세계 각국의 자본을 낮은 비용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FDI유치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FDI유치는 다양한 경제 모델 육성을 위한 seed money 마련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R&D관련 유사 산업군의 cluster를 국내에 구축하여 기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FDI유치가 타국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며 한국지엠의 호샤 사장, ADT캡스의 브래드 벅월터 사장, 한국 미쓰이 물산의 나카지마 사장, Solvay코리아의 안드레 사장에 의하면 그 주된 원인들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잦고 불규칙적인 세무조사, 감사, 잦은 노사분규 그리고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해외 수출 금지가 그 주된 원인들입니다.

이 중 일관적이지 못한 세무조사, 감사와 복잡한 행정절차 문제를 해결하여 한국이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일시적이고 이벤트성의 징벌적 규제를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초에 있었던 남양 유업

사태를 보면 정부의 기업 관련 규제 정책이 비일관적이고 여론에 따라 일시적이고 이벤트성의 징벌 규제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 유보금 액수가 많은 것은 연구, 개발 투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낙농분야 기업들에게는 일반적인데 당시 남양에게만 이와 관련하여 특별 감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증명합니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징벌적 규제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국내의 세법,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지식이 부족한 외국계 기업, 자본들은 투자 유인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정 요구와 여론 형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규제와 관련하여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을 하되 몇 가지 예외 항목만 규제를 하는 자유도가 높은 규제 정책입니다.

산업 기반이 전무하던 싱가포르가 항공정비산업인 MRO에서 세계 8위로 도약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은 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의 규제를 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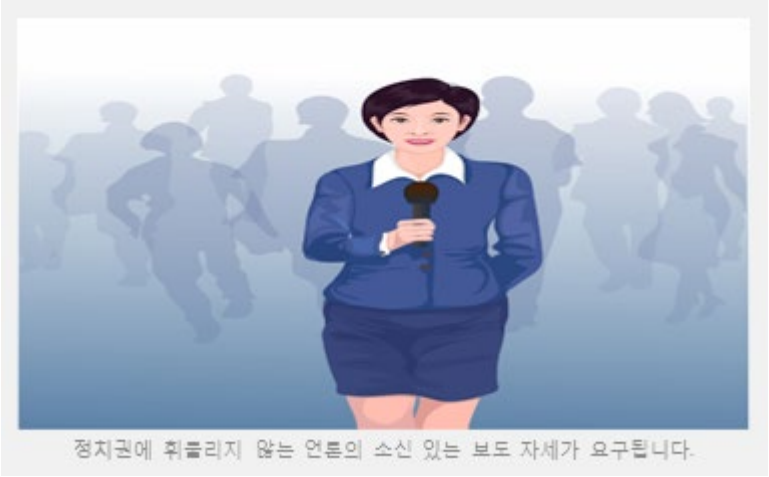
반면 항공 운송 산업 세계 8위에 있는 우리나라가 MRO에서는 작년 기준 2.8%의 저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항공정비산업의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도가 낮은 규제정책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부 규제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가지 걸림돌이 존재하는데 바로 관료 사회의 저항입니다. 관료들의 기득권은 60년대 정부주도 경제운영이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고착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낮아지면 규제권자인 관료들에게 규제권한을 통해 얻는 반사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네거티브 시스템의 규제 방식이 채택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정부 규제가 선진국 형으로 바뀌어 FDI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 선진화가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식 선진화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정치권, 정부 부처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관료 사회의 선진적 개혁 사례, 모범적인 공무원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의 소신 있는 보도 자세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 한국지사 사장 4인이 지적한 한국의 기업 환경과 관련한 4가지 문제점들 중 일관적이지 못한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논의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행정 규제의 개혁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의식 선진화가 우선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선결 과제 해결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여도 FDI유치를 통한 경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규제 정책과 관련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되며 정부와 국민 쌍방향의 지속적 환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견 환류와 관련한 토론 문화 정착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토론 문화의 정착, 경제 선진화를 위한 KEY입니다.

⑳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한국은 우수한 잠재능력을 가진 기업이 많지만 외국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술의 핵심경쟁력과 생산이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낙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브레드 벅웰터 ADT 코리아 사장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노사분쟁을, 나카지마 토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일관성 없는 감사시행 절차를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세르지오 호샤 한국 GM사장은 노조파업으로 인한 생산성저하에 대한 우려를,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영기술의 해답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우수한 역량을 지닌 한국기업이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효율적인 정부정책이 한국기업의 성장가도에 발목을 잡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정책에 있어서 높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앞으로의 예측가능성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투자계획의 일관성이 불투명하고 이러한 요소는 기업간의 신뢰도 형성에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중에 룰을 바꾸지 않는다' 는 원칙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정권이 바뀌더라도 외국인 투자정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경하거나 계획을 번복할 수 없도록 제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간의 소통방식의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정책 변경 내용을 공지할 때 한글로 공지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정책변경에 따라가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간의 배려의 부족이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역량발휘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 스스로 역량발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에 대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로 인해 북한변수와 빈번한 세무조사와 같은 규제강화로 인해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정부가 전폭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여 외국기업의 높은 신뢰를 얻는다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발판이 될 것이고 나아가 한국 경제도 발전하여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발걸음 또한 가볍지 않을까요?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이성룬, 정복경, 김진섭, 석신호, 안병욱

이성문(윤리교육 4) : 바쁜데도 불구하고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에 메일로 초청장과 토론문을 보내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 월 27 일, 한국인의 기업환경에 관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FDI, 서비스 영역 위주로' 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통해 제조업만이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FDI 유치가 필요함을 알리려 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교육 영역'에서 많은 투자유치를 통해 더욱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번 연구모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에 대한 의견을 '사범대학' 학생의 입장으로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FDI 즉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하여 '서비스 영역'에서의 투자유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석신호(윤리교육 4) : 일단 현재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감합니다. 한정적인 내부의 자본만이 아니라, 화수분과도 같은 무한한 외국의 자본을 한국의 경제를 위한 투자에 사용한다면 그 잠재력이 상당히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병욱(윤리교육 4)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앞에서 이성문 학우가 말씀해주셨던 것과 같이 '서비스 영역'에서 예를 들어, 금융 혹은 오늘 논의할 교육 영역에서 아직은 미진한 FDI 를 유치하는 것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섭(윤리교육 4) : 나눠준 칼럼에서도 쓰신 것처럼, 우물의 물이 만약 고갈 되었다, 그러면 계속 고갈된 땅만을 파면서 가능성 없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문(윤리교육 4) :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해 현재 한국의 성장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또한 '서비스' 영역에서의 투자도 이루어져야 함은 동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서비스

영역에서도 '교육' 영역에서의 FDI 가 유치된다면 어떠한 영향 혹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할지 각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복경(윤리교육 4) : 저는 교육영역에서의 FDI 유치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근대적 교육시스템을 유지해오면서 발전시켜온 선진 교육시스템이 한국에 투자와 함께 들어올 것이므로, 한국의 기존 교육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했던 혹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쿨하우스 전략을 통해 들어진, 싱가포르 교육의 질

자연히 한국의 학습 대상자들에게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 깊이도 깊어지게 되어 자연스레 한국 전체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로 싱가포르를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글로벌 스쿨하우스 전략'을 통해 외국의 유명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교육시장을 개방하고, 범 정부적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유럽최고 경영대학원 중 하나인 프랑스의 인시아드를 필두로 시카고 대학 등 10 개의 세계 유명 대학 분교와 존스 홉킨스대, MIT 공대 등 8 개 대학과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대학들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도 이에 기인한 것이며, 교육시장에서의 투자 유치를 통해 2015 년까지 2 만 2000 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될 정도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병욱(윤리교육 4) : 만약 그와 같이 된다면 유학생들을 적극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현재 유학수지 적자 43 억 달러라는 암울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이 들어온다면 굳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비용을 쓸 필요 없이 국내에서도 충족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진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주환경이 잘 갖춰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외국의 고급인력들이 투자와 함께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될 경우 가족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시장에서의 적극적 FDI 유치를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이 외국자녀에게도 이뤄질 수 있게 된다면 '투자'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국내에서의 생산성 향상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석신호(윤리교육 4) :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자칫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경제적 수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통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계층 간 이동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시장에서 영리적인 특성을 가진 외국자본투자가 증대된다면 자칫 돈벌이로 교육을 이용하여 지금도 문제점이 있는 교육에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유치된 영리법인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의 경우 대략 연간 4500 만원 안팎에 이릅니다. 앞서 언급한 교육의 역할과 그 의미를 고려해볼 때 교육영역에서의 FDI 가 가져올 부정적인 역할도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FDI 유치에 있어서,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김진섭(윤리교육 4) : 여기에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에서 교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육환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육을 신분상승의 혹은 계층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교육기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가뜩이나 문제가 되어 있는 교육에서의 지나친 경쟁구도를 더욱 증대시키고, 교육비부담을 가중시키며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학 혹은 교육기관의 '서열화'에도 한 몫 할 것으로 보여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하거나 경쟁력 제고만이 아닌 형평성과 공공성도 끌어올리는 것도 목표로 삼고 FDI 유치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복경(윤리교육 4) : 물론, 교육에서의 공공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학교를 유치하되 일정 소득의 일정비율의 액수는 반드시 '교육' 부분에서 법인들이 재투자를 하게 하는 규정을 만든다던지 혹은 .교육기회 평등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제도 즉,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방법들을 통해 골고루 교육도 받게 하면서 그 수준과 경제적 이득을 모두 잡을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병욱(윤리교육 4) : 저는 기사에서 교육서비스 영역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가령 한 국제

학교가 한국에 분교를 설치할 경우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때 여러 단계적 규제가 존재해 설립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설립 승인을 받을 때까지 2 년이 걸린 기관도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경제개발청이 외국 학교 설립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투자관계자를 연결해주는 것과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문(윤리교육 4) : 지금까지 서비스부문, 그 중에서도 '교육'영역에서 FDI 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영향들, 그리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교육영역에서의 FDI 의 유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의 글로벌 스쿨하우스 전략을 성공사례로 들면서 국내 교육의 수준이 선진 교육시스템과 자본의 유입으로 상승할 것이며 또한 유학비용의 절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주환경을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교육' 그 자체가 갖는 공공성이 위협될 수도 있음을 큰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매우 높은 교육비로 인해 실질적인 '귀족학교'가 되어 교육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또한 가뜩이나 높은 교육경쟁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교육 그 자체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방안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제도의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시키되 지나치게 영리위주로 간다거나 혹은 추가이윤을 '교육영역'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규정을 만들어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임형욱, 서연우, 김영우, 김동하, 권인성

서연우 (고대국제 3):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82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는 '외국인이 바라본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입니다.

이번 월례토론회 참석하신 4 명의 CEO, 세르지오 호샤 GM 코리아 사장, 브래드 벅웰터 ADT 코리아 사장, 나카지마 토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과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들은 각각 한국에서의 기업활동에서 무엇이 어려운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각 비효율적인 노사관계,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불규칙적이고 잦은 세무조사와 지적재사권의 보호의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중 저는 노사관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배포한 칼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같은 편이라는 인식 변화, 그리고 이에 기반한 인센티브에 바탕을 둔 봉급제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혹은 발제문에서 다뤘던 문제 중에 무엇이 원인이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떠한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비효율적인 노사관계

임형윤 (고대국제 3): 저는 세르지오 호샤 사장의 발제문에서 볼 수 있었던 다른 선진국인 독일과 미국과의 임금상승률 비교, GDP 대비 연봉 등 여러 수치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노동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임금인상이지만, 임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야근일수가 많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업복지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 내에서 받는 많은 압박과 부담이 많습니다. 또한, 일을 그만두고 퇴직하였을 때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며, 단축된 근무년수 등이 근로자에게 많은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임금인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이 있을 때라도 당장 돈을 더 벌어야 놓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요구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노사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기업복지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보장을 하거나 현재의 연금 시스템을 개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 근로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연우 (고대국제 3):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수치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나라의 특수한 기업문화, 치열한 취업경쟁, 부실한 연금 시스템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이로 인해 계속적인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군요.

이에 따라 국가가 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그만두었을 때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나 법들을 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분들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김영우 (고대국제 3): 기업은 흔히 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영리'의 뜻을 배웠는데,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이윤 극대화가 아닙니다. 영리법인은 법인인데, 소속된 사원들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영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사 간의 공동체 의식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3 년 이상 근무하였을 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이를 남용해 3 년이 넘어가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였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노동상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과 인식으로 인해 노사 간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려하여 생각한다면,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 강화나 기업이 소속된 사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사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임형윤 (고대국제 3): 저도 이에 동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절감, 인건비 감소라는 명목 하에 비정규직 사원들을 너무 함부로 대해서 기업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추락시킨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사원들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했을 시, 이를 인정해주고 이에 따른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우 (고대국제 3): 인간을 단순한 하나의 노동상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을 그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시군요. 기업도 결국에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그 구성원들은 적절히 대우해주어야 하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혹시 다른 의견은 없나요?

권인성 (고대국제 2): 사실 노사 간의 문제가 나타나는 곳들은 화이트 칼라보다는 제조업과 같은 육체적 노동이 많은 곳들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옛날부터 이어져오는 기업문화로 인해 고용자와 노동자들의 의식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IT 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들은 기업문화 자체가 유연합니다. 이에 따라 노사 간의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노사문제는 특정 산업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기업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은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문화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바꿔야지, 법이나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연우 (고대국제 3): 노사 간의 문제가 특정 산업의 특징이라는 생각이네요. 특히, 기업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스스로 인식 변화를 하지 않은 이상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이시군요.

하지만, 세르지오 호샤 사장이 준 발제문의 자료들을 읽어보면, 단순히 기업문화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나라의 비해 야근일수, 수준 높은 노동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노동생산률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인성 (고대국제 2): 물론, 숫자는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나라의 자동차 공장은 그렇게 많은 야근일수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공장보다 생산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들에게 넘겼는데, 사실 설비 자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럽의 공장의 생산설비 자체가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 우리 나라보다 노동생산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숫자를 해석할 때에는 그 숫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교변수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우(고대국제 3): 좋은 지적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임형윤 학우가 말했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에 많은 동감을 하는데, 근로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김동하(고대국제 3): 저도 그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들은 대졸 신입사원보다는 특정 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경력직의 사람들을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생산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대졸 신입사원을 고용하지 않고 단순히 그 산업에서 이미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고용한다면 전체적인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연우 (고대국제 3):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보다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이 트랜드입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일자리 수는 미미하겠지요.

기업들이 경력직보다는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임형윤 (고대국제 3): 정책적으로는 규제를 시행할 때 조심해야 하고 현재 있는 규제들에 대한 완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예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하루를 쉼으로써 6 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정책을 시행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으로 인해 금지되어 있는 여러 산업부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연우 학우에게서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자동차 개조 산업과 같이 규제로 인해서 아예 우리 나라에서 없는 산업부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들로 완화시킨다면,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일자리 수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연우(고대국제 3): 오늘 일자리가 구하기 힘들어 생기는 불안감, 현재까지 비정규직을 하나의 노동상품으로 취급하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노사 간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의견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단순 숫자만의 비교의 위험성,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늘 토론에서 나타났습니다. 한 시간 가량 동안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 82 차 월례토론회 '외국인이 바라본 우리 나라의 기업환경'을 주제로 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인섭, 유성렬, 이현영, 정다은, 김민재, 정원석, 오세원, 오상택, 정선우

정원석(연대시생 4) :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선진화 연구모임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토론문을 이메일로 보내드렸듯이 2 월 월례토론회는 외국인 CEO 4 분을 모시고 '외국인이 바라본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경제는 지난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연평균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3.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점점 늘어나고 경제구조가 3 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보다 2 차 산업인 제조업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요인 중에 내부성장요인이 고갈되어 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성장요인인 자유무역협정(FTA)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FDI 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경제성장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CEO 들은 한국의 기업환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3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관세에 관한 규제의 잦은 변경, 노사관계의 비효율성 및 임금문제, 많은 규제들로 인하여 제한받는 기업환경 등을 한국 기업환경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막는 규제완화

저는 이 중에서도 규제들로 인하여 제한 받는 기업환경이 FDI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FDI 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세원(연대행정 2) : 요즘 박근혜 정부도 규제완화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제완화가 이루어 진다면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할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영(연대식영 3) : 제가 뉴스를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작년 법률을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는 규제가 더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원석(연대시생 4) : 그렇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집단들의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다운(이대산디 3) : 저도 우리나라의 한가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역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해당 지역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보호하고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면 규제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선우(연대시생 4) :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정원석(연대시생 4) : 네 그렇다면 현재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민재(연대사회 2) : 토론문에 ADT 코리아 브래드 벅월터 사장은 자신이 송도에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송도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발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여러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들어나는 송도신도시의 야경

유성렬(연대생공 석사) : 연세대학교도 송도에 투자를 하여 국제캠퍼스를 만들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나 학교들과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송도가 외국인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상택(연대사회 석사) : 송도 같은 외국인 투자처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점 중 하나가 수도권 지역에 투자가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와 송도신도시 같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원석(연대시생 4) : 송도신도시를 예로 들어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시행되고 있는 규제완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인섭(연대시생 4) : 정원석 학우의 블로그에도 나와있듯이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제일 뜨거운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병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재(연대사회 2) : 외국인들이 투자할 병원은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큰 병원들 아닐까요? 이러한 규제완화가 대형병원과 개인병원의 격차를 점점 더 벌리게 되지 않을까요?

유성렬(연대생공 석사) : 저는 우리나라의 특정 병원에 투자가 몰릴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많이 뒤쳐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우(연대시생 4) : 저는 경제구조에서도 대기업이 번창해서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중소기업들이 받쳐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리병원 규제완화는 대형병원을 한층 더 성숙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전반적인 의료계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석(연대시생 4) : 영리법인 병원 설립 규제완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이대산디 3) : 이번에 시행된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 중 어떤 토끼를 잡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상택(연대사회 석사) : 제 생각에는 그린벨트가 규제완화되면 그 지역의 숲을 다 제거하고 골프장을 만들 듯이 환경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환경적인 측면은 보호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현영(연대식영 3) : 투자를 통해서 그 지역의 환경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국립공원 같은 경우 현재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리를 기업에게 맡기게 된다면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더 깔끔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원(연대행정 2) : 외국기업의 투자와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모으면서 환경을 지키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정원석(연대시생 4) : 지금까지 한국에 걸쳐있는 규제들을 살펴보면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나 경제적인 성장을 살펴 보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지키려고만 해서는 발전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이끌어내고 성장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WOZYkhMYoDo

④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지현(경영1),엄태양(경영3),신다정(경영4),공현덕(경영3),유승호(경영3),박제진(경영3),김은솔(경영1)

공현덕(경영 3):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관한 이번 월례토론회 주제는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노동 경쟁력과 FDI'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작성하였습니다.

발제문과 초청장에 나와있듯 이번 토론회는 ADT 캡스, 한국 GM, 솔베이, 미쓰이물산의 CEO 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었는데, 그 중 노동 조합의 강성,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을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다정(경영 4): 제 생각에는 지나친 규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적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한 편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맨큐의 경제학을 보며 배운 것이, 규제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도 경제적 순이익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적 규제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현덕(경영 3): 네 맞습니다. 그에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한국 미쓰이 물산 CEO 의 발언이 기억에 남는데, 국가의 기업 감사나 세무조사가 절차나 기간, 범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려면 2,30 년을 내다보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 입점 수가 2,000 여 개나 된다고 하지만 우리 나라는 8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박제진(경영 3): 그렇게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 우리 나라 기업이 우리 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숫자가 점점 떨어지고, 해외에 투자하는 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엄태양(경영 3): 넥슨이라는 기업도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본사를 일본으로 옮기고, 한국에 있는 기업을 넥슨코리아로 바꿨다고 합니다.

지현(경영 1): GM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한 내용에서 이러한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네요.

김은솔(경영 1): 외국계 기업이 우리 나라에 입점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우리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니,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제진(경영 3): 맞습니다. 그런 외국인 직접 투자를 FDI 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유치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신다정(경영 4):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FDI 유치를 위해 직접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하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FDI 유치를 위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유승호(경영 3):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규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외국계 기업을 우리 나라에 많이 들여온다면,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현덕(경영 3): 네, 하지만 대기업이 산다고 해서 꼭 중소기업이 죽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부속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품들을 중소기업들에게 하청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기업이 산다면 중소기업이 죽는다.' 는 말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태양(경영 3): 네, 그렇게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로 나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대기업들이 나중에 사업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중소기업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유승호(경영 3):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국 기업 환경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유능한 대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너무 대기업 위주로만 선택한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인재들을 뽑기 힘들고, 쓸 만한 인재로 만들려면 교육을 해 줘야 하는데, 교육 후에는 대기업으로 스카우트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현덕(경영 3):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노동 분야, 예를 들어 노동 조합이나 노사 관계에 대해 아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신다정(경영 4): 이건 예전에 들은 수업 내용이었는데, 일본 기자가 자기한테 묻기를, 한국은 왜그렇게 노조 때문에 고생을 하냐고 묻더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노조의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이 우리 나라에 투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현덕(경영 3): 맞아요. 브래드 벅월터 ADT 캡스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노사 간의 갈등을 ADT 캡스는 잘 해소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사 관계에 신경쓸 시간을 아껴 비즈니스에 투자하기 때문에, 훨씬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김은솔(경영 1): 네 그렇게 리더와 팔로워들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중간 관리자들이 사원들을 잘 챙기고, 사측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도모한다면 노사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 관리자들에게 노사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권위나 권력을 부여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현덕(경영 3): 맞습니다. 그렇게 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공인노무사'라고 하는데, 제가 회화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와 얘기하다 노무사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Labor lawyer'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단 비교적 많이 확산되어 있는 추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공인노무사를 잘 모르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현 실태에 대해 짚어볼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들어보고 토론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다정(경영 4): 아까도 말했듯,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통해 본 자료인데, 2008 년에 비해 현재 규제가 1000 개 정도가 늘어난 형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규제에 대해 검토해보고, 부적절하다 싶은 규제들은 완화하거나 없애야 우리 나라에서 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호(경영 3): 그런데 이런 것을 또 정부에서 주도한다고 하면 예상 되는 문제점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보수는 일베충, 진보는 빨갱이' 이렇게들 말하는데, 물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들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동세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현 정부를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 또 휴전 국가인 우리 나라의 특성상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현(경영 1): 우리 나라는 전쟁 이후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규제나 질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규제들을 '당장 바꾸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태양(경영 3): 맞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얼마 전 갑작스럽게 '셧다운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냈고, 관련 기업의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하도록 규제가 개편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넥슨의 경우도 본사를 일본으로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신다정(경영 4): 네, 투자자들도 법인세와 같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에 제약이 따르는데, 이런 제약을 없애주는 것이 FDI 유치를 위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유승호(경영 3):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아까 말한 반기업 정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공헌에도 힘을 기울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공현덕(경영 3):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연구모임에서 대화를 통해 얻은 기업환경 개선의 방안으로 우리가 얘기해 본 것들은 '규제의 완화, 표준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 등이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사용자와 노동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경쟁력 상승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임금 결정'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보너스 수당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는 생산성과 기업에 대한 신뢰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그것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국가 경쟁력을 통해 FDI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번 연구모임을 진행해보았는데요, 학우들 모두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 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⑤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김민균, 신나리, 김원아, 서동진, 심영섭

김민균(신방 4) : 학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메일로 토론발제문과 초청장을 보내드렸듯이 지난 2 월 27 일,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기업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제 82 차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특히 외국인 CEO 가 직접 참여하여 생생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기업환경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이 토론회에서 외국인 CEO 들은 크게 4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 GM 사장은 작년 60 개국 중 56 위로 거의 꼴찌 수준인 대한민국 노사관계 경쟁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강성노조와 높은 임금으로 인해 경영하기 힘들다는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카지마 토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한국 세무조사의 예측 불가능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이사이기도 한 브래드 벅월터 ADT 코리아 사장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활동해 투자를 늘리는데 자신감을 얻도록 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벨기에 화학업체인 솔베이의 안드레 노톰브 한국 대표는 투자에 반하는 연구·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조도 덧붙였습니다.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과 외국기업간의 제휴가 활성화되려면 중소기업 기술이 사장되거나 원청 대기업들에게 빼앗기는 현상을 막아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안드레 노톰브가 언급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열쇠를 막는 요인 중 〈지적재산권〉이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 인식과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선진의식운동에 대해 칼럼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해외로 투자를 더 돌리게 되는 것을 막고 외국인이 한국으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싱가포르는 <지적재산권>이 잘 지켜진다. 그로 인한 이익은?

서동진(문헌 4) : 저는 이번 연구모임을 준비하면서 싱가포르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강력한 법치국가로도 유명한 싱가포르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야 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법 규제를 통해서 정부자체가 글로벌 리더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고, 교류가 많아짐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국가였습니다.

김원아(식생 4) : 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와 반대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조사했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감시국가로도 지정이 되어있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적재산권 감시국가로 리스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리스트에서 벗어났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김민균(신방 4) : 그렇습니다. 해외의 대조되는 사례를 지적재산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싱가포르와 상대적으로 전문가도 부족하고, 잘 안 지켜지는 중국에 대해 들어 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잘 안 지켜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서동진(문헌 4) :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친 기업적 성향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이 매우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즉, 기업환경이 잘 되어있고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국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존자원이 없기에 더욱 이러한 강력한 법 제도를 통해서 R&D 도 유치하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아시아 최고국가라는 명성도 얻고 있습니다.

심영섭(행정 3) :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권으로 나라 입장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더욱 세밀하고 복잡해지는 사회 현상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많아질 때, 그 때에 지적재산권이 더욱 잘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나리(사복 4) : 한국의 지적재산권 판례 같은 경우에는 “왕의 남자”에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대사에서 “키스”라는 희곡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권리자 허락과는 상관없이 판결에서는 기각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민균(신방 4) : 신나리 학우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한국 판례 중 원작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우를 조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권이 잘 안 지켜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류상품들이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들도 그것들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원본의 가치가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들이 모여있는 여기도 그렇지요.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copy cat’의 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미지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 이미지도 낮고 때로는 오명도 얻고는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동진(문헌 4) : 예를 들어 음악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전 mp3 파일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음악 = 공짜’ 라는 인식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그 이후 가수들이 불법 음원 다운로드 금지 캠페인을 열었지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동시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불법 무료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들이 폐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정식 음원 판매 프로그램 중 하나인 멜론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달 몇 천원 투자로 마음 놓고 쓰기를 원했고, 인식이 음악은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도 한 몫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음악을 한 달 5 천원 내외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음질에 좋은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값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아(식생 4) : 그렇습니다. 저도 또한 같은 인식의 변화 느꼈습니다. 법적인 제재와 규제도 실제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돈을 자연스럽게 내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정규 음원 제공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저도 돈을 낼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물론 편해졌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값 정도의 돈으로 한 달간 음원을 내 마음껏 그리고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에 대해 좋은 쪽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행정 3) : 기술의 발전도 한 몫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멜론>이라는 음원 제공 프로그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적재산권>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지적재산권>이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민균(신방 4) :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음악>관련 좋은 사례에서 조금 더 발전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영화관을 갔을 때 우리는 <굳 다운로더>라는 캠페인의 영상을 하나씩 보게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의 저작권 보호에 비해 취약한 영화 컨텐츠 보호에 대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나리(사복 4) : 일반소비자들, 즉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잘 지켜야 궁극적인 <지적재산권>보호가 잘 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굳 다운로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회의감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그 영상 캠페인은 익숙하나 과연 파급이 있을까? 라는 물음이 뒤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멜론 같은 경우 음원 제공 프로그램인데 이들은 제휴도 많이 하면서 이용자들이 상대적 문턱을 낮춰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손쉽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잘 보호했던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 관련해서도 <굳 다운로더>라는 캠페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략적 케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행정 3) : 저도 <굳 다운로더>의 경우에 회의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영화 상영 직전에 <굳 다운로더>를 봅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약간 잔소리 같다.. 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은 이해하지만, 나는 이렇게 영화관에 돈 내러 보러 온 사람인데 왜 굳이 나한테까지 〈굳 다운로더〉를 인식시켜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가졌었죠.

물론 지재권문제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매장의 음악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면서 소송이 걸렸던 판례가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했던 판결들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대한민국에는 법은 있지만 정확한 잣대가 아직은 부족하다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관련해서 캠페인이 회의감이 드는 이유도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판례들의 인식 때문이 아닐까요?

김원아(식생 4) : 회의감이 물론 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당신들은 〈굳 다운로더〉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들은 〈굳 다운로더〉입니다 라는 시각에서 보면요?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 회의감이 들지, 자부심이 들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균(신방 4) : 그렇습니다. 같은 지적재산권 캠페인에도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이 있는데, 그 세세한 분야별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간 7 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저성장 이였습니다. 이를 해결할 열쇠는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열쇠를 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적재산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copy cat 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으며, 하나의 최근 사례를 말씀 드리면 〈커피빈〉이라는 커피 체인점이 최근 국내에서 〈커피빈 칸타빌레〉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국내 대법원은 〈커피빈〉손을 들어준 것이 성공 사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외 다국적 기업인 커피빈과 국내 롯데 계열 그룹 코리아세븐이 판매하는 커피빈 칸타빌레와의 상표 소송건에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아져야 우리는 〈copy cat〉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내외적 인식의 변화로 우리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원아(식생 4) :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까 멜론처럼 어떤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제휴나 배포 가격 등등의 합의점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저 스스로도 '나는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 스스로도 작은 캠페인의 실천, 선진시민의식 실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서동진(문헌 4) : 저도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싱가포르 사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아 이 나라는 부존자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지켜지는 법 조항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가 많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앞선 사례의 음악의 좋은 발달과정처럼 다른 모든 것들도 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균(신방 4) : 각자 분배한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저도 또한 그랬습니다. 이제는 영화도 바뀔 때입니다. 멜론처럼 영화도 이젠 인식의 개념이 바뀔 때라는 것을 우리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악과 영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지적재산권을 지키면 모든 국민이 지킬 것이며, 그렇게 모든 국민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지켜주게 되면 기업도 지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 순환적인 과정이 반복되었을 때 외국 기업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copy cat'의 개념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학생의 시선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외국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멜론의 사례로부터 우리의 음원에 대한 인식과정 변화를 우리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고, 이에 발전해서 우리부터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지킬 때 〈copy cat〉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고, 전 국민이 모두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더 이상 강력한 규제/법에만 단순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우리부터 스스로 지키는 선진시민의식운동을 할 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잘 지키는 것은 과거 우리의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진시민의식 운동과 우리의 의식의 변화로 이 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의 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출처 :
사진 2 - http://youtu.be/l4dhs4xgiF0
사진 3- http://youtu.be/MxjwboOyoK4
사진 4-http://youtu.be/B7gPdRY9ECI

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김수현, 현미란, 이예원, 김정아, 백다혜

김수현(성신 지리 3): 지금부터 성신여자대학교 제 1 차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구모임은 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82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였던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세르지오 호샤 GM 코리아 사장님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한국의 잦은 법의 개편'에 대하여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면 매번 대규모의 정부조직과 법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FDI 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기업의 국내 유입은 저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생산요인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에 3 배 가까이 된다고 하니 FDI 의 확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몇 년 간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글로벌한 시대에 맞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과 정부조직의 잦은 개편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있어 한국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권의 변화와 법과 정부조직의 개편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법과 정부조직의 개편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화된 시대에 맞추어 글로벌 스탠다드한 정부조직과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한 부분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진 4 인의 다국적기업 CEO 들이 지적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월례토론회에서 4 인의 CEO 가 이야기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본인이 생각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미란(성신 지리 3): 저는 노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상주에 있어서 대학 진학 후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취 생활을 하다가 집에 가려고 기차표를 예매하려다 보면 종종 철도 노조 문제 때문에 기차표를 구하지 못하거나 이미 예매를 해 둔 표였음에도 기차가 파업으로 운행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곤 해요.

한국의 노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어요. 거의 꼴지 수준으로요. 툭하면 파업을 하는 노조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노조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아마 FDI 의 증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현(성신 지리 3):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미란(성신 지리 3): 기업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조문제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에 간단히 해결하기도, 쉽게 손대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노사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업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백다혜(성신 지리 4): 저는 노조도 노조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이 측면이 문제라고 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없이 그저 공짜로 혹은 더 싸게 누리는 것을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저는 이번 학기에 강의시간에 사용할 교재를 정당한 대가를 내고 교내 서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강의를 수강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불법 제본책을 들고 다니더라구요. 이것도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모습이라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우선 작지만 우리들이 먼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주변 생활에서부터요. '나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대학생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아(성신 지리 3): 저도 백다혜 학생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운 측면이 있어요. 이는 이러한 한국의 이상한 문화를 처음 접하는 외국 기업이 국내로 유입될 때에 문제로 작용합니다.

제 친구들 중 외국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하나같이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공짜를 좋아한다고 평가하더라구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 기업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 시장의 소비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내려 하지 않는데 과연 한국의 시장에 뛰어들고 싶을까요?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혜 말처럼 대학생들이 솔선수범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익 광고와 같이 자주 상기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문득 생활하다 광고를 보고 '아 맞아, 지적재산권!'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김수현(성신 지리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짜만을 좋아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루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베끼기 문화라는 이상한 문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 한국 과자는 일본 과자를 표절했다.와 같은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적재산권을 중요성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이나 한 기업이 변화한다 해서 나아지진 않겠죠.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이예원(성신 심리 3): 저는 김수현 학생이 칼럼에 썼던 법의 지나친 변경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예측불가능성과 비슷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일관성 없는 감사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있어 누군가가 갑자기 불시에 우리의 소지품을 검사한다던지 하게 되면 어떨까요? 불안해서 못살겠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일관성이 있는 감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칼럼에서 언급하였던 법 문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이죠.

김정아(성신 지리 3):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라는 것이 나 지금 너 검사하러 간다. 하고 가면 그게 감사인가요? 그 기업이 어떤 일을 잘 하고 있나, 법은 잘 지키고 있나.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시 감사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현미란(성신 지리 3): 저는 두 사람의 의견에 모두 동의를 하는데요. 감사라는건 불시에 이루어지는게 옳지만 어떤 기업은 하고, 어떤 기업은 안하고 하는 식의 감사는 없어지는게 옳다고 봐요. 정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불시에 감사를 하되, 일관성 있게 모든 기업을 감사해야겠죠.

김수현(성신 지리 3): 네. 외국인 CEO 들이 지적한 한국 시장이 지닌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한국의 노조 문제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한 측면, 그리고 일관성이 부족한 감사를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백다혜 학생이 이야기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측면에 많은 공감이 가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경제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인 FDI 의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반드시 해결되어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칼럼에서 지적한 지나치게 잦은 법의 변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국의 법과 조직의 변경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아(성신 지리 3): 저도 정부의 정권변화에 따른 법과 행정조직의 개편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권이 바뀌면 이전의 정책이 잘되었던 못되었던 과는 별개로 무조건적인 대규모 개편만을 시행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이지요.

투자라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지만 그래도 무언가 예측이 가능한 잣대를 두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한국 사회는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예원(성신 심리 3): 스포츠 경기 중에 규칙이 바뀌는 일이 없다고 칼럼에서 비유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이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와중에 법이 자주 변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투자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시는데 매번 한국 시장이 투자에는 사실상 위험요소가 큰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가 지속된다면 외국인 직접 투자인 FDI 가 국내에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엔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현미란(성신 지리 3): 저는 다소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한국 사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과 법,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변화하는 세계상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지금 지구촌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더 이상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맞추어 법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다혜(성신 지리 4): 물론 변화하는 세계에 맞추어 국내 정세가 바뀌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너무도 짧고 잦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국과 관련이 깊은 외국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대선보다 한국의 대선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다른 국가들은 정권이 변화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나친 대규모 개편이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정권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현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현미란(성신 지리 3):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행만 봐도 그렇죠. 요즘같은 지구촌 시대에서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옷이 금세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민감하게 세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세계의 정세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사회가 변화하는 것이 과연 옳지 못한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그때 그때의 트랜드에 발맞추는 것 같아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유연한 조직운영, 국가운영이 아닐까요? 마치 패션의 선두주자처럼 한국이 빠르게 그때의 국제 정세의 유행을 캐치하는 것이죠.

김정아(성신 지리 3): 그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론 법의 개정이 마냥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한 나라의 정부조직과 법을 이러한 유행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맞을까요?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의 경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선 단순히 옷, 패션과 같은 유행의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수현(성신 지리 3): 잦은 법의 변경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잦은 법의 변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과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었는데요.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추어 상황에 맞는 법안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유연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는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법과 조직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칼럼에서 문제로 제시한 법의 지나친 변경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보다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기 위하여, 또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선진국의 사례나 혹은 본인이 생각한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아(성신 지리 3): 저는 이번 연구모임을 준비하며 유럽연합인 EU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도 EU 처럼 무언가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만이 아닌 여러 국가의 정책과 법안이 표준화가 되어야겠지만요. 표준화된 정책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줄지 않을까요?

표준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할 때 본국과 다른 법이나 정책 때문에 혼란을 겪는 일도 줄어들테고 아무래도 칼럼의 주제였던 잦은 법의 변경 문제도 한결 나아질것 같습니다.

이예원(성신 심리 3): 물론 표준화된 기준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이상적인 해결방안일 뿐입니다. 아무래도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선진국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정권의 변화에 맞춰 매번 법이나 조직을 개편을 하는 악습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펼치고 있는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가 끝난 후 그대로 폐기되는 것이 아닌 그 다음 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아주 나쁜 법안임에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고쳐야 하지만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일종의 온고지신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미란(성신 지리 3): 저는 사실 아직도 꼭 이 부분이 문제로만 적용되는건지 모르겠어요. 분명 장점도 있는데 말이죠. 글로벌 세계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서 바뀌는 것이 마냥 잘못된 것일까요? 옳지 못한 비유라 했지만... 변화하지 않는건 일종의 유행에 뒤쳐지는 것과 비슷한게 아닌가요?

무조건 바꾸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적절히 조합하는게 좋다고 봐요. 세계는 변화하는데 우리만 도태되는건 안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법의 변경 또는 조직의 변경을 단순히 정권의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게 아닌 일종의 개혁이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작정적인 정권이 바뀜에 따른 법의 변경은 지양하되 필요에 따른, 국제 정세에 따른 개혁은 지향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백다혜(성신 지리 3): 사실 저는 처음엔 잦은 법과 정부, 제도의 변화를 안좋게만 봤는데요. 저와 대조되는 현미란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마냥 나쁘다고 단정 짓는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미란학생이 제시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런 이상적인 해결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김수현(성신 지리 3):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백다혜(성신 지리 3): 전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판단하는거죠. 제가 문제점으로 제시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서도 저는 해결책으로 대학생, 국민의 참여를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모든 국가적 문제 해결의 핵심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이 법과 정부의 제도의 변경에 관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거죠. 이것이 과연 현미란학생이 이야기했듯 타당한 이유를 가진 변경이라면 지지하고 단순히 정권 변화에 발맞춰 이유불문하고 변경시키려면 과감하게 반대해야 하는거죠. 국민의 의견표출이 필요하다고 봐요.

김수현(성신 지리 3): 저는 생각치도 못했던 부분인데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닌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비난과 비판은 확실히 다른거니까요.

김정아(성신 지리 3): 정말 좋은 의견이예요.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앞장서면 좋지 않을까요? 대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대외활동의 형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참여가 국가적 문제 해결의 핵심

김수현(성신 지리 3): 네. 정말 좋은 의견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치게 잦은 법과 조직의 변경에 대하여 많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해결책으로는 법과 조직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선진국 벤치마킹, 그리고 좋은 것은 수용하되 나쁜 것은 과감히 불용하는 것과 이에 대한 국민의 참여유도와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미란학생과 백다혜학생이 이야기한 무작정적인 법의 변경을 지양하되 이유있는 변화는 지향하는 해결책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오늘 연구모임은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나치게 잦은 법의 변경을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한국의 강력한 노조문제,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지적재산권 문제,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감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조문제로는 기업문화의 변화를, 지적재산권에서는 생활 속에서의 작은 변화로부터 또 공익광고와 같이 와닿는 수단을 이용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일관성 없는 감사에서는 불시에 검사를 하되 모든 기업에게 일관성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이야기한 지나치게 잦은 법의 변경 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찬성과 반대, 두 가지의 의견으로 양분되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추어 법과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유없는 대규모 개편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나치게 잦은 법의 변경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법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선진국의 사례에 맞추어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무작정적인 정권이 바뀜에 따른 법의 변경은 지양하되 필요에 따른, 국제 정세에 따른 개혁은 지향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촉구된다고 이야기해 주셨구요.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나눠주신 성신여대 학생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연구모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⑦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김수연, 한지송, 김희정, 이혜지, 문정인

김희정 (숙대영문 2): 2014 년 숙명여자대학교 첫 번째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달,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위해 한국에 진출한 여러 외국기업의 최고 경영진 네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보았는데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ADT 코리아의 브래드 벅 월터 사장님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좀 더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베이코리아 안드레 노롬브사장님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과거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도 이를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미쓰이 물산의 나카지마 토오루 사장님은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외환거래 절차 규제 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감사가 좀 더 일관성있게 이루어질 때 해외자본가들이 좀 더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바로 한국 GM 의 세르지오 호샤 사장님이셨습니다. 호샤 사장님은 한국의 현저하게 낮은 노동 경쟁력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노사관계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도 종종 거리에서 시위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곤 하는 이 노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노사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한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문정인(숙대영문 3): 한국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호샤 사장님께서 제시해준 표는 정말 충격인데요, 안 그래도 노동경쟁력이 낮은데 2012 년에 비해 2013 년에 그 순위가 더 떨어졌다니 하루빨리 이를 개선해야겠습니다.

김수연(숙대영문 3): 저 또한 노사갈등 문제를 우선순위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술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탄한 노동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외국의 투자를 끌어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값싸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지송(숙대영문 3): 저희 대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진들이 호소하는 경영의 어려움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현장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거리에 뛰쳐나와 근로조건 개선을 외치는 노동 조합을 보고 저도 모르게 기업이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모임을 준비하면서 이 시위가 단순히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해외 자본가들은 이와 같은 한국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혜지(숙대영문 3): 저는 지난 2 년 간 숙명여자대학교의 리더십그룹, 한국문화교류단에서 활동했습니다. 한국문화를 알리면서 여러나라에서 온 외국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가 한국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뉴스에는 한국의 시위, 파업현장이 종종 보도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로 인해 안전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외국에서 뉴스를 통해 한국 소식을 접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험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희정(숙대영문 2): 맞습니다. 노사갈등은 단순히 경영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공급해줄 수 있는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노사갈등을 보고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본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우리 대학생들도 이를 더 이상 남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사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의 생각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방안

문정인(숙대영문 3): 저는 노사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그 해결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노사갈등을 해결한 성공사례로 유한킴벌리를 찾아보았는데요, 유한킴벌리는 1 년에 두 번 조합간부들과 회사측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영현황을 논의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1 일차에는 여러 명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체육행사 등으로 친목 또한 다집니다. 그리고 2 일차에는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토론결과를 듣고 필요한 답을 내놓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한지송(숙대영문 3): 저 또한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함께 지향할 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 또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혜지(숙대영문 3): 저는 도요타자동차 회사를 노사갈등 성공사례로 찾아보았습니다. 도요타자동차는 1950 년대 도산위기 때 75 일 간 총파업으로 종업원의 사분의 일을 해고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후에 노조가 파업권을 회사에 반납하고 정년이 연장되고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등 함께 상생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노조는 자발적으로 임금동결을 선언하기도 했구요. 이 덕분에 2002 년 일본 기업사상 최고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희정(숙대영문 2): 노사갈등의 해결책이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에 있다고 모두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얘기해주셨는데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이혜지 학우 분께서 도요타자동차 회사가 총파업 후에 전체 근로자 중 25%를 감축시켰다고 하셨는데 이를 노조가 받아들였다는 것에서 의아했습니다. 혹시 노조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혜지(숙대영문 3):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파업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이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회사가 우선 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도요타를 살리기 위해 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총파업이 노사로 하여금 고용안정은 회사가 안정적이고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희정(숙대영문 2): 결국 회사가 잘되어야 근로환경도 개선될 수 있는 것이군요. 우리나라 기업은 직접적으로 도요타회사 같이 아픔을 겪기 이전에 도요타 사례를 보고 이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것들은 없을까요?

문정인(숙대영문 3): 저는 아까 유한킴벌리 회사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에 이어 신뢰 구축의 중요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실천하는 윤리경영, 투명경영은 노조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한킴벌리의 사례를 또 가져오자면 한국적 비즈니스 관행으로 판매처와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리베이트를 당시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이 판매처에서 쫓겨나면서까지 거부했던 사건인데요, 여기서 리베이트란 자기 회사의 물품을 판매해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물질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문국현 사장님은 영업사원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래처 담당자들에 대한 술 접대와 골프 접대도 금지시켰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노조로 하여금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김수연(숙대영문 3): 윤리 경영과 함께 경영진이 가져야 할 태도로 종업원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자세를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중심의 경영입니다. 예전에 한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일본의 미라이 공업의 야마다 사장은 사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원이라면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가장 일하고 싶을까 고민하는 것이지요. 야마다 사장은 이런 고민 끝에 제공되는 환경이 사원들로 하여금 회사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희정(숙대영문 2):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서 경영진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윤리 경영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과 인간중심의 경영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노조가 가져야할 마음가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지송 (숙대영문 3): 저는 근로자들이 경영진과 같은 책임감을 가짐으로써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면 어떤 방향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혜지(숙대영문 3): 저 또한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측은 노조 위원장에게 어느 정도의 경영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출과 이익, 지출내역 등을 상세히 설명해준다면 회사의 사정을 더욱 잘 알게 됨으로써 더욱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여러 노조파업 중에는 일방적인 임금 상승을 위해 파업, 투쟁을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고가 결정이 되고, 노동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기업의 중요한 일이 결정되는 것이 파업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들이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 진행하는 일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정(숙명영문 2): 근로자들의 책임감이 노사갈등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셨고 이를 위해 경영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만큼 경영인들뿐만 아니라 근로자 분들도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이혜지(숙대영문 3): 그렇습니다. 기업과 노사가 경쟁하는 사이가 아닌 협력하는 동업자 사이라는 것을 경영진 측에서 정보공유를 통해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많아진다면 동업자의 관계는 형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더 이상 자신들을 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갑이라고 생각할 때 노사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희정(숙대영문 2):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사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여러 국가의 노사관계 선진사례를 미리 조사해주신 덕에 더욱 활발한 연구모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 저희는 노사갈등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맨 먼저 유한 킴벌리 사례를 들어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서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투명경영이 노조로 하여금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견고히 쌓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경영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의견은 바로 근로자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경영진이 근로자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전 P&G 회장인 리처드 듀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돈, 건물, 브랜드를 남겨놓고 직원들을 데리고 떠난다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더라도 직원들을 남겨 둔다면 우리는 10 년 안에 일어설 것이다.”

러처드 듀프리 회장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원들 없이 회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 없이 직원들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사는 서로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 일어나는 시위현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사갈등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둘 간의 관계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격려과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쌍방향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발전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더 이상 노사갈등을 타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노사는 이들의 지지하에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⑧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이보람, 서유진, 남아영, 김현아, 윤새안 (이상 이대교육4)

남아영(이대교육 4) : 먼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미리 메일로 초청장과 토론문을 보내드렸듯이 지난 2 월 27 일,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8 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2.9%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장요인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3 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타개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꼽는데요.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이를 막는 한국 기업환경의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나카지마 토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를 문제점으로 꼽으셨고 브래드 벅월터 ADT 코리아 사장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 코리아 사장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미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세르지오 호샤 GM 사장은 '노동 경쟁력 약화'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근로자들의 취약한 노동 경쟁력의 원인으로 노조 파업과 경직된 노동시장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노동 경쟁력 취약이라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인 노사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올바른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사범대생으로서,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보람(이대교육 4) : 저는 학교의 역할, 그리고 대학교육이 오로지 직업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대학교육의 목적이 직업교육이 되는 식의 생산성 제고 방안은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다만 학교에서는 어떤 노동현장에 가더라도 직업교육에서 사용되는 역량(Competence)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창의성과 적응력과 같은 측면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유진(이대교육 4) : 저 역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장면의 변화보다는 직무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과 더불어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통해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생산성의 문제를 교육 장면에서 중시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과급제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어느 정도 수정에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새얀(이대교육 4) : 저도 앞선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고임금의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는 장인정신을 강조하는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차용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교육과 직업교육 간의 문제가 이야기되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임금 대비 생산성의 문제를 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인 고졸자들을 선진국의 생산성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보람(이대교육 4) : 추가적으로 저는 마음을 교육한다고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따라서 생산성 증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의 조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허츠버그의 위생이론을 배우며 물리적인 것이 변화하면 비로소 정서적인 것도 함께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의자 하나만을 변화시킨다고 하여도 그것이 주는 정서적 의미가 궁극적인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호손 전기 공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메이요 교수는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여 생산성을 제고하였다고 이해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비공식적 분위기의 형성이 그 근본 원인이었는데요. 이처럼 물리적 변화가 가져오는 정서적 변화를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아(이대교육 4) : 저는 교육학적으로 보았을 때 창의성 증진이 결국 생산성 제고로 이어진다고 봐요. 앞서 역량 이야기도 했는데 창의성이 이를 대표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기술직과 제조직만으로는 우리나라는 커다란 장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를 위한 R&D 센터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또한 교육과는 다소 동떨어진 문제로 여겨지겠지만 외국의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이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로지 외국의 유명한 대기업이나 P&G 와 같은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육과 연관하여 생각할 때 대학원생이나 경영학과, 경제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적 여건 마련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은 물리적 변화가 정서적 변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가져 온다

남아영(이대교육 4) : 대부분이 생산성 제고를 위한 물리적 변화와 정서적 변화의 측면을 주로 말해주셨는데요. 역시 고졸자의 훈련을 통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 제고에 덧붙여 저는 직업훈련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인적자원 개발에 지역구를 활용한 미국의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이나 영국의 '국가숙련혁신계획(21st Century Skills)'을 본받아 인력자원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인력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유진(이대교육 4) : 저도 여성과 노인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 임금피크제와 같은 방안이 이야기되는 것도 실은 오래 근무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많이 주게 되지만 그에 반해 생산성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재능기부의 측면으로, 미국의 은퇴자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처럼 쌓인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나라 역시 존재하지만 이의 활용도는 낮기 때문이죠.

남아영(이대교육 4) : 네, 동의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노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이는 국가적인 낭비이며 이들을 통해 임금 대비 높은 생산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문제인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유진(이대교육 4) :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임금 문제와 노사 간의 상호 불신에 기반한 대결적 구도를 먼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앞서 이야기 나왔듯 동기 유발의 측면이 주목되어야 하고 더불어 돈을 버는 노동자가 아닌 개개인의 가치를 중시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성에 토대를 둔 인식변화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노동자 스스로가 구조 안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공동체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 내 가족 여행 프로그램이나 직원 자녀를 초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새얀(이대교육 4) : 하지만 제도 측면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과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앞서 생산성 제고의 방안으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물리적 변화를 토대로 한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맛있고 영양 좋은 식사를 통해 기업 내 안정적인 분위기와 화목한 식사시간 조성을 이용하여 비공식적인 공동체 형성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가져온다면 이것이 궁극적인 생산성 제고 및 갈등 완화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동시에 적절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람(이대교육 4) : 저 역시 노동자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노동자들의 노동이 어떤 결과를 창출하고 본인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돌아오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단순히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 회사에 주요한 인물로 노동이 얻는 보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한 투명성 있는 공지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김현아(이대교육 4) : 저는 노사를 갈등의 구조로 바라보는 인식 자체의 전환도 요구된다고 봐요. 단순히 이들을 갈등 관계로 낙인 찍을 것이 아니라 직업 환경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지요. 물론 임금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의 생산성을 얻으려는 노력과 시도가 있다면 또 다른 국면을 마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아영(이대교육 4) : 저 역시 노사를 문제적 상황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지만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건대 상황 접근적 모형을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앞서 언급된 기업 내 분위기 개선을 통한 갈등의 완화도 중요하지만 노조측과 기업측의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적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 받는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지요.

윤새얀(이대교육 4) : 제가 생각하는 방안도 이와 유사합니다. 기업 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상호동의 하에 이 불만을 익명으로 전달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지요. 기업측에서 궁금해 하는 노동자의 입장도 들을 수 있으며 직접적인 전달이 아닌 객관적인 인물을 사이에 끼고 있기에 서로 부담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한다면 갈등이 줄어드리라 생각해요.

이보람(이대교육 4) : 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든 게 미국의 공공부문 연방파트너십위원회(National Partnership Committee)입니다. 이 기구는 상설기구인데 노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요. 최대한 중립적인 성격을 지녔고 노사측의 입장을 듣고 이를 해석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잠재적으로 생길만한 문제는 미리 중재를 시도한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에요. 물론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기업마다 이 기구를 본보기로 삼아 기업 내 인사교육을 담당하는 HRD 부서에서 전담하여 일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남아영(이대교육 4) :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본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를 가로막는 노사 문제와 더불어 궁극적인 노동경쟁력 향상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근시안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적 측면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적 방안으로는 첫째로, 장기적 관점으로 창의성과 같은 역량 개발 및 인성교육의 측면을 이야기해주셨고 둘째로,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차용하여 고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해주셨습니다. 셋째로, 교육학 이론을 바탕으로 물리적 변화를 토대로 한 정서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 역시 지적해주셨습니다. 넷째로, 직업훈련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인적자원 개발에 더욱 힘쓰자는 의견에, 경력이 단절된 노인과 여성을 활용하여 재능기부의 측면으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 형성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어 이루어진 노사 갈등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동기유발의 측면에 주목하여 첫째로, 공동체적 분위기 형성, 둘째로, 식사와 같이 소소한 물리적 변화를 통한 심리적 안정, 셋째로, 인센티브제 활용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넷째로, 이어 자아효능감의 확보를 위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결과를 투명성 있게 공지해줘야 한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었고 마지막으로, 기업 내 상담센터 운영 및 미국의 연방파트너십위원회와 같이 노사측을 조율하는 중립적인 기구의 개설 역시 논의되었습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앞서 다루었던 내용과 더불어 궁극적인 교육시스템 및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변화를 위해서 물리적 변화를 통한 정서적 변화나 동기유발의 차원에 집중하였으나 확고부동한 선진국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요구되지 않나 생각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미흡하지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연구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⑨ 성균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안예은, 이명은, 배하연, 이재현, 김수연

배하연(교육 3):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보내드린 초청장과 토론문에 언급된 바 있듯이 지난 2 월 27 일,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토론의 주제인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월례토론회에 참석하신 4 명의 외국기업 CEO 들은 입을 모아 한국에서 기업 경영하는 것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발제자들은 외국기업 국내 유치에서의 장애물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지적했습니다. 브래드 벅웰터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르지오 호샤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나카지마 토오루씨는 빈번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세무조사 및 감사를 문제점으로 들었으며, 안드레 노톰브는 국내에 외국인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R&D 센터들을 만들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13 년 9 월까지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64 억이지만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515 억 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요인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3 배나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여러 장애물로 인해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빈번한 세무조사 및 감사가 예측가능성을 낮추어 국내투자 유치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은 처음 투자를 시도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나, 이것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세무조사 및 감사는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세금 납부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빈번한 세무조사 및 감사 이외에도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를 방해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토론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에서의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또 그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장애물 극복

이재현(교육 3): 저 역시 기업의 회계감사 부분에서의 일관성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MD(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2013 년도 국가경쟁력에서 회계감사 부분 60 위 중 58 위를 차지했습니다. 12 년도 발표에서 41 위였던 점을 감안할 때, 장애물의 벽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하려면 안정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감사를 진행하는 대상 기업도 정해져 있지 않아 대비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싱가폴의 경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세무감사와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 제도와는 거리가 멀어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가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배하연(교육 3):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재현(교육 3): 해결책에 관해서는 배하연 학우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우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세무감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대한 전문 인력 구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 인력이 관련 법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차츰 개선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은(교육 3): 저는 두 학우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비정기적인 감사가 불만일지 모르지만, 그 기업이 투명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정기적인 감사도 분명 필요할 것 같아요.

이재현(교육 3):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적이지 않은 세무감사의 개선에 더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업종별, 지역별로 소급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알맞은 일관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연(교육 3): 빈번한 세무조사 및 감사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역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회사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한미 FTA 에 따라 정부기관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써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불법소프트웨어를 쓰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기관에서조차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감사 자체가 구비가 잘 되어있지 않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 투자할 마음이 생기겠지요.

이명은(교육 3): 저도 김수연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투자수익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9 년 EU 보고서에서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효율성을 높인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수익률이 낮은 것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비해 투자수익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이지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로의 경우보다 싱가폴이나 영국으로 R&D 센터 유치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배하연(교육 3): 이명은 학우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R&D 센터는 매우 적게 나타납니다. 국내에 유치된 R&D 센터가 8 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R&D 활동수준을 비교하는 지표인 GERD 를 비교하면 R&D 지출액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었으며 2006 년을 기준으로 OECD 전체국가의 GDP 2.26%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R&D 센터 유치가 힘든 이유는 외국기업이 R&D 투자를 늘리면서 이에 대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매년 늘려 2017 년에는 20 조로 확대할 추세이기는 하나 투자금 회수 시간을 단축하고 경로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예은(교육 3): 앞서 언급해 준 부분들도 모두 개선이 필요하지만, 노사분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앞서 이재현 학우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IMD 에서 발표한 국제경쟁력 지수를 언급했는데요. IMD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지수가 3 년 째 60 개국 중 22 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사관계 생산성이 52 위로 거의 꼴등이며, 외국인직접투자가 56 위입니다. 전체 국제경쟁력 지수가 22 위인 점을 감안할 때, 노사관계 및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EF(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도 전체는 148 개국 25 위인 반면, 노사협력이 132 위, 해고비용도 120 위로 거의 꼴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GM 기업은 노사 분규 끝에 우리나라가 고비용 국가로 기본급 인상과 통상임금 문제로 임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한국 공장 일부를 스페인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배하연(교육 3): 노사분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이죠. 저 역시 노사분규가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에 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장벽으로 FDI 를 유치하려 한다면, 여러 장애물들이 창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사간의 신뢰 확립

그렇다면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장애물, 그 중에서도 노사분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예은(교육 3): 노사분규는 문화적 차이에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계약주의, 우리나라는 온정주의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01 년 일본기업인 한국 후지 제록스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기업의 경우 제 1 의 바른 외국인 기업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조측이 임금 협상 방식의 폐해를 들면서 8%기본급 인상과 2%성과급 인상을 제안하자 기업측에서는 1% 기본급 추가하여 무교섭 임금 협상을 이어냈습니다. 이로서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때 노동자들이 격주 토요일 휴무를 자진 반납하고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를 쌓아 상호보상을 해왔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도 노사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명은(교육 3): 안예은 학우의 의견에 덧붙여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국내 노동법도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세계 17 개국에 설립되어 있는 게이츠 기업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노동법에 위배한다는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사간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법의 글로벌 표준화도 필요합니다.

배하연(교육 3):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위협적 태도를 해소하는 것 역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에서 실질 기업 경영권을 잡고 놓아주질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 이후에는 국내 기업 경영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노동법의 글로벌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배하연(교육 3): 노사분규에 대해 좋은 의견 제시해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FDI 유치를 위한 R&D 센터 유치 방안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해요.

이명은(교육 3): 저는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 R&D 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전문성이 최근 투자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IT 기술의 경우 중국 등이 재빠르게 쫓아오고 있어 그 수명이 짧은데,

때문에 부품소재, 의료 바이오와 같은 산업에 대한 성공적 안착이 필요합니다. 또한, R&D 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불투명한 투자정책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이 살기 어려운 분위기가 극복되어야 하겠지요.

김수연(교육 3) : R&D 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또한 지원금보다는 사회적 인프라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해 정보를 범국민적으로 보급하고 전문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한 해외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와 접촉을 거듭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벌금도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이재현(교육 3) : 제가 듣기로 4000 여 개의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폴의 경우는 국내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자본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내 산업 기반의 발전과 동시에 해외 기업 유치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배하연(교육 3) : 영국의 경우 외국의 금융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국제금융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986 년 금융서비스업법을 제정하여 외국 은행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한 것이 그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활발한 FDI 유치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노사분규와 문제점 극복을 통한 R&D 센터 유치에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노사분규와 관련해서는 노사간의 신뢰 형성, 노동법의 글로별 표준화 등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또한, R&D 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우들이 지원금보다는 생활 환경 즉 사회적 인프라를 방안으로 들어주신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근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동의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에 대한 장애물에는 빈번한 세무조사 및 감사, 지적재산권 보호, 노사분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비정기적 감사, 비일관적인 감사에 대해 다른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학우도 있었던 반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학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지금,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FDI 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의 현실적 장벽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는 요인에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이승창, 김예지, 이영조, 고원이, 김보경, 서태준, 박장수

이승창(경영 3) : 학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미리 토론발제문과 초청장을 보내드려서 아시다시피 지난 2 월 27 일,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기업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특히 외국인 CEO 가 직접 참여하여 생생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기업환경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이 토론회에서 외국인 CEO 들은 크게 4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카지마 도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한국 세무조사의 예측 불가능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학업체인 솔베이의 안드레 노톰브 한국 대표는 투자에 반하는 연구·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즉, 투자에 반하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르지오 호샤 한국 GM 사장은 작년 60 개국 중 56 위로 거의 꼴찌 수준인 노사관계 경쟁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강성노조와 높은 임금으로 인해 경영하기 힘들다는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세르히오 호샤가 언급한 한국의 강성노조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칼럼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현재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해외로 투자를 더 돌리게 되는

것을 막고 외국인이 한국으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서태준(경영 3) : 저는 이번 연구모임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노사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UN 산하의 국제노동기구에 1991 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88 개 조약 중에서 한국은 고작 24 개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188 개 모두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과 다른 선진국이 40~60 개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면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원이(미술 4) : 저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세계에서 꼴지 수준이라는 자료를 보고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사갈등이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보호운동에서 끝나는 것인 줄 알아서 필요한 것 인줄만 알았지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꼴찌 수준을 보여주는 한국의 노사관계

이승창(경영 3) : 그렇습니다. 노사관계가 거의 세계 꼴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문제점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나친 노사갈등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넘어서 오히려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점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의 노사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김예지(미술 4) : 저는 어떤 기업이 노사갈등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의 경우 1949 년 이후로 단 한번도 노사분규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임금동결에 노사가 적극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노사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좋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영조(경영 3) : 저도 도요타의 사례를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1967 년 발표된 노사공동선언에는 도요타 자동차 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서명했습니다. 이 선언을 통해,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회사의 번영과 근로 조건의 개선을 추구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도요타에서는, 최고경영진과 노사 간부 간의 대화를 포함, 여러 단위에서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가 공식적으로 마련됩니다. 인사부장이 노조 간부들과 만나고, 현장 관리자들은 현장의 노조 대표들과 만납니다.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직급에 관계 없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승창(경영 3) : 도요타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호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드러난 점이 노동자의 신뢰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노사간의 신뢰확립

박장수(경영 3) : 도요타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요타의 문화를 우리나라 기업에 바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도요타의 기업문화가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으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확보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자사의 기업문화를 잘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창(경영 3) : 그렇습니다. 한가지 방식이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면 노사갈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문화를 고려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개방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확보가 사전적인 해결책이라면 사후적으로 노사갈등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김보경(경영 4) : 사실 한국의 노사단체교섭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노측과 사측만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해결을 시도합니다. 이 경우에 노측과 사측 그리고 두 진영을 조정할 수 있는 제 3 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태준(경영 3) :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사갈등을 해결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알선조정청, 영국의 경우 자문알선중재청을 두고 노사 간의 의견을 중재할 전문가를 지원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노사정위원회가 있지만 이곳에서 합의를 못보고 정부의 압박으로 노사갈등이 마무리되는 모습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승창(경영 3) : 사후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노사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재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사갈등과 관련된 경험을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김보경(경영 4) : 지난해 제가 모 기업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원이 중간관리자와 만나 6 개월마다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업무성과를 평가 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계발을 통한 사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나타나는 수익을 성과급의 형태로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면 노사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장수(경영 3) : 우리 아버지가 다니고 계시는 회사는 아직 호봉제로 연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여제로 연봉체계가 바뀐다면 생산성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봉제와 성과급여제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임금피크제를 널리 시행하여 생산성을 점차 늘려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봉제 개선을 통한 노동자 복지 개선

이승창(경영 3) : 오늘은 노사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토론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을 가로막는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러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사전적으로 지속적이고 개방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확보, 사후적으로 노사간의 의견을 중재할 중재전문가 양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의 시행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다시 직원의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여 하루빨리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갖춘다면 한국의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 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송경남(경영 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참석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저상장으로 인해 , 장기 경기 침체 징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고 성장률을 높여야 하는 절체 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재도약의 열쇠는 국내 및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활성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기업의 해외로의 투자의 3 분의 1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지난 2 월 27 일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 라는 주제로 4 명의 외국인 경영자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 강성 노동운동과 노조의 불법파업이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된다고 입을 모았으며. 또한 예측 가능성 없는 세무조사와 지적재산권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4 명의 외국인 경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바로 노사관계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강경한 노조와 잦은 파업 등으로 비용은 증가하고 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중 특히 호샤 한국 GM 사장은 잦은 파업 등으로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60 개국 가운데 56 위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성 노조로 인해서 자신의 하루 일과 절반을 노사문제에 쏟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외국 기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노사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악어와 악어새는 대표적인 상리공생관계입니다. 악어새는 악어 이빨 사이 음식물을 통해 배고픔을 달래며, 악어는 악어새라는 작은 치과의를 통해 건강을 얻습니다.

그런데 만약 악어가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악어새를 잡아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어와 악어새는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상리공생은 편리공생의 관계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과 종업은 상리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리공생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한 핵심요소는 바로 '신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과 종업원 간의 관계를 보면 '신뢰'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사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노사간의 관계에서 신뢰 회복에 대한 사례나, 노사간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해결되었던 사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혜린(아동 3): 저는 먼저 노사관계에 대해 조사하면서 국내의 신뢰회복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일신방직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신방직은 면방업계에서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의 선도자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일신방직은 "노동계와 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노측과 사측이 거리감을 좁히고 인식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신방직은 업계 최초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주 40 시간제 대비 7 개조 3 교대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통한 종업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통한 함께하는 사회구현 등 창조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통해 업계 최고의 생산성과 품질을 달성해 성공적인 노사관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운영관행을 탈피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도 도입에 앞장서는 등 성공적인 노사 협력으로 생산성향상과 품질 안정에 기여했던 것 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리공생의 노사관계

송경남(경영 4): 일신방직의 사례는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상당히 많이 접해본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노사관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일신방직의 운영을 보면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차별성으로 종업원들에게 자긍심과 동기부여를 부여해준 상리공생적 관계에 아주 적절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찬열(법 3): 저는 법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법 시행이나, 법 제도 쪽에 관심이 있어 기업내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사례를 찾아보았는데요.

에스텍의 사례입니다. 에스텍은 전 종업원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종업원 주주회사로서 협력적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기본 틀로 장, 단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노사관계 정책수립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사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근로자의 생명 보전 및 안전보건 유지와 증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사를 대표하는 각 5 인씩을 선임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업과 직원들의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경남(경영 4): 에스텍의 사례는 기업이 정확한 제도의 틀을 제시함으로서 종업원과의 신뢰를 개선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방법을 종업원에게 따라오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종업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면서 기업과 종업원이 맞추어 가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윤경(아동 3): 저는 유한킴벌리에 대해 조사해보았는데요. 유한킴벌리는 기업과 종업원들 간의 신뢰관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1970 년 80%에 가깝던 시장 점유율이 1995 년 당시 18%대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적자를 내는 부분도 발생하면서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고 생산성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의 존폐가 걱정되는 위기를 겪고 있던 유한킴벌리가 선택할 수 있던 방안은 인원감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는 IMF 시절에 직원을 감원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유한 킴벌리는 3 조 3 교대의 주당 56 시간 근무를 4 조 2 교대 주당 42 시간을 근무하게 함으로써 인원감축이 아닌, 근무시간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유한킴벌리의 근무시간 조절은 종업원들에게 과로에서 벗어나 충분히 휴식한 뒤 작업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필요 없을 때 직원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지 않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마인드를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노조와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묻고 신뢰를 하여 이를 경영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업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종업원은 따라가는 것이 아닌, 종업원의 의견을 묻고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은 점점 기업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유한킴벌리는 결국 회사 재기에 성공하고 5 년 동안 매출이 2 배 이상 뛰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송경남(경영 4): 유한킴벌리는 국내의 대표적인 윤리경영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유한킴벌리의 IMF 당시 인원감축이 아닌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종업원도 해고 하지 않고 회사를 다시 1 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례는 기업과 종업원의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찬열(법 3): 결국 요즘 노사간 분쟁의 주된 이유는 기업과 종업원 양층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임금'이 노사 간 분쟁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기업은 최소비용을 통해 최대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임금을 인상시키려고 하다 보니 양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의 판결 또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야근수당,잔업수당 등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하여 다뤄진 부분으로서 사회의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법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이 주제에 대해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그 동안 애매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에 대해 좀더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그 동안 애매하게 분쟁되었던 통상임금에 포함 될지 말지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 주었습니다.

제 의견은 기업과 종업원이 각 양측의 비용최소화를 통한 임금동결과 생활력 향상을 위한 임금인상이라는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너무 분쟁하기보다는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진 만큼 정해진 기준을 모두 받아들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분쟁에 쓰여질 에너지를 회사 발전에 기여하여 회사의 역량을 키우고 생산력 증대와 매출성장을 이뤄내어 그 몫을 나누어 가지는 방향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혜린(아동 3): 저는 일신방직의 신뢰회복 방안 중에 아동학과로서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집을 설치함으로써 직원들이 자녀를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근무 시간에 보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 걱정하지 않고 일을 편안히 할 수 있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직원마다 근무시간이 다름에 따라 유연한 보육시간을 운영해 야간 보육을 하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 질 것입니다. 직원들이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신뢰도도 높아져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재연(경영 3):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 공직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게 되면, 워킹 맘의 경우 1 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 시간 일찍 퇴근함으로써 아이의 등교나 하교를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의 이탈도 방지할 수 있고,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생기는 일에 대한 집중도 하락 역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유연근무제의 시행으로 학원과 근무를 병행하는 경우 직원들은 이를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은 자신의 삶에 보다 더 만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근무능력까지 향상될 것입니다. 즉, 유연근무제는 직원만족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 회사 입장에서는 핵심인재를 확보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력적인 근무시간은 직장과 가정생활 간 갈등을 감소시켜,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도를 제고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직무만족이나 가정생활과 관련된 노사문제 역시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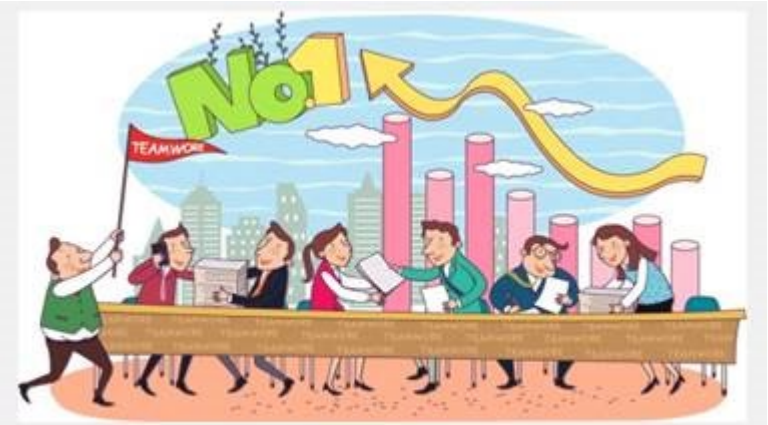
이덕주(행정 3):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사 관계 문제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전체의 큰 그림(기업의 성공)을 그리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분배의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경영진은 노조가 기업의 이익은 대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따진다고 말을 합니다.

기업에서 모든 위치가 다 중요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경영자의 위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영자가 먼저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기업에서 종업원이나 직원들을 공장의 부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사는 함께 가야 하는 파트너라는 것을 CEO 들도 인식해야만 합니다.

더 많은 대화를 위해 채널을 만들어내야 하고, 기업의 일급비밀이 아닌 정보는 제공해줘야 합니다. 기업의 사정을 모르고서는 노사 간 신뢰 있는 대화를 할 수 없고 신뢰 또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조 또한 기업사정을 알아야 좀 더 경영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도 기업 사정은 모르는척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부분이라면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일하고 있는 기업이 없어진다면 자신들의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여 기업 사정에 맞지 않는 복지, 임금 등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리 한다면 노사관계에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노사 간 정보공유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공개 하고, 대화채널을 만들고, 노사 간 서로가 인식을 전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하나의 팀, 기업과 종업원

송경남(경영 4): 오늘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어떻게 하면 노사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찬열 학우는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기업과 종업원과의 제도적인 임금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기업은 정해진 임금을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서 기업과 종업원 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 기업과 종업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혜린 학우 또한 신뢰관계 형성의 한 방안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종업원들의 복지의 개선, 특히 어린이집 개설과 같은 방법으로 자녀문제를 기업이 해결해주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연 학우는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도 모든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선택하여 근로자들의 가사 문제나 자기계발 시간을 제공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신뢰관계형성의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덕주 학우는 신뢰관계 형성에 있어서 기업과 종업원은 서로가 숨기는 것이 없이 모두 공개를 하여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을 만듦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신뢰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과 종업원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은 기업이 자신들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가족 즉, 공동체로서 인식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은 종업원이 기업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양자 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악어와 악어새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Win-Win 이 되는 상리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노사들 또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으로 서로에게 Win-Win 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노사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노사문제는 외국기업에게 있어 골칫거리가 아닌, 매력적인 측면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⑪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전용택, 고성현, 주연아, 오민석

주연아(경영 3):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논의를 진행할 사안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 FDI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화 포럼에서는 지난 2 월 27 일,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례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사관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느꼈고, 이후 '노사협력으로 이루어내는 FDI 유치'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국내 노사 간의 관계가 호의적이지 못한 상황에 대한 토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발언 부탁드립니다.

전용택(융합전자공학 3):국내 노사간의 불화를 보여주는 가장 예를 생각하면 저는 얼마 전 있었던 '코레일 파업' 이 생각납니다. 이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여겨져 결국 핵심 인물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파업이 국민들의 동의를 기대했음에도 결국 외면당하고만 이유는 논리적인 명분도 없고, 사측과 제대로 소통해 보려는 노력없이 파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헌(자연환경 3): 저 또한 전용택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덧붙이자면, 코레일측이 파업을 하며 들었던 이유가 많은 부분 논리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결국 코레일이 민영화될 것', 또한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면 국내자본의 위치가 위협받을 것' 따위의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고보면 한국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으로 파업을 외치기 전에 사측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소통'을 통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민석(생명과학 4): 저는 '노사'가 '노동자'와 '회사', 두 주체의 조합인 만큼 사측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호 타이어 파업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당시 금호 타이어 노동자들이 일하기를 거부한 이유는 기존에 회사가 노동자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에서 보면 막무가내식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회사 또한 노동자와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상호 간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노와 사,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일 테니까요.

전용택(융합전자공학 3): 구조적인 요인 또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사관계 개선이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대다수의 구직자가 대기업 취직을 목표로 하는 구조에서 과연 노사간의 평등이 가능할까요? 단적인 예로 근로계약서만 보아도 대기업은 '갑', 근로자는 '을'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노력을 통한 노사관계 개선

주연아(경영 3):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사측과 노동자, 둘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책없는 노동자의 파업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회사 또한 노동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

그렇다면 노사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노동자와 회사, 두 주체들 모두에게 피해가 간 사례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들이야 말로 결국 노사 간의 화합이 전제되어야 회사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노동자들의 직장도 더욱 긴 시간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한 사례로 저는 강원도에서 있었던 한 택시회사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본래 이 운수회사는 상시근로자 32 명에 25 대의 택시를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해갔던 중견 택시회사였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1 억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던 비교적 건실한 기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노동자가 기존 환경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노동운동을 진행했는데 결국 두 주체의 대립이 너무 극심해져버린 나머지 회사가 문을 닫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노동자, 회사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이유는, 노동자는 단시간 안에 일자리를 잃은 셈이 되어버렸고, 회사는 제대로 계속 회사를 경영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기 때문이지요.

당시 사장 측은 노조가 진행한 노동운동의 정도가 너무 과격했으며, 노동자들이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상급 노동단체가 제시해 놓은 규율을 그대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견 운수기업의 입자에서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요구했던 10 개의 항목 중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있으신가요?

고성헌(자원공학 3): 저는 노조결성에 대한 노사 간의 태도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이것이 두 주체 간의 대립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운전학원의 예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이 학원 또한 안정적으로 경영을 해 가던 학원임에도 겨우 보름만에 노사 간 대립으로 문을 닫기에 이르고만 회사입니다. 노동자 측이 노조를 결성하겠다고 하자 자동차 학원장은 이미 노조가 있는데 또 다른 노조는 결성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경히 반대했다는 것이지요.

즉, 노동자 측은 기존에 있던 노조의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는 노조결성을 통해 확실한 단체를 결성하겠다는 것이었고, 학원장은 또 다른 노조의 결성을 위협적으로 바라본 것이지요.

사측이 단지 노조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또한 문제이지만 노동자측은 '노조결성'이 무조건 회사에 강경한 입장으로 '요구'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연아(경영 3) :다음으로는 화목한 노사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선진국의 예와, 대학생의 관점에서 제안할 수 있는 노사관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헌(자연환경 3): 저는 칼럼에서 이야기하신 도요타 자동차 회사의 예를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즉, 양측의 입장을 '한축에 달린 두개의 바퀴'로 빗대로 표현한 것이 참 독특하면서도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의 이미지와도 결부시켜서 이해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사원들과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모토' 같은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민석(생명과학 4): 구글에서는 사내 '미끄럼틀'을 통해 사원과 회사간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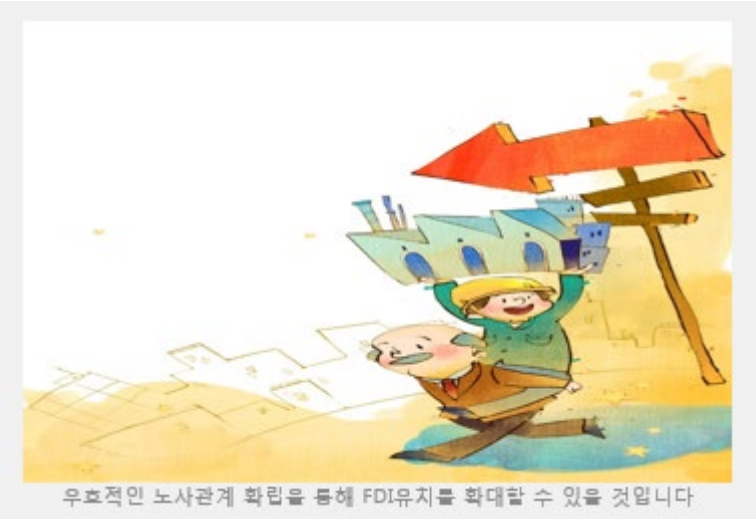
구글에는 잘 알려진바와 같이 사원들을 위해 준비된 놀이시설이 많은데 한번은 두가지 종류의 미끄럼틀을 두고 '어느 미끄럼틀이 더 마음에 드는가?' 에 관한 투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미끄럼틀이 사내에 실제로 설치되게 되는 것이었죠. 이런 투표과정에 사원 모두가 참여함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공동체'에 속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이지요.

전용택(융합전자 3) : 고성헌 학우가 얘기한 도요타의 모토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것인데요, 도요타처럼 뭔가 모토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우리는 하나다.’ 라던지, ‘노동자와 회사는 서로 신뢰한다.’ 처럼 핵심 철학을 요약할 수 있는 모토를 정한다면 모두가 언제나 무의식적으로도 공동체 정신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토는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겨울마다 연탄배달 봉사를 가기도 하고 사회봉사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것처럼 교내에 사랑의 정신이 실천될 수 있는 것과 같이 회사에서도 이러한 모토를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민석(생명과학 4): 저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계기 같은 것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노동자와 회사 모두 결국은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자연히 서로를 위하게 되고, 소통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교내 동아리에서도 임원진들이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더 잘 듣고, 함께 친목도모도 할 수 있도록 엠티를 떠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연아(경영 3):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노사 간 대립의 원인, 그리고 선진기업을 통해 배울점,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았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최근 일어났던 코레일 파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동자 측은 이익을 위해 고집스런 모습만 보이기보다는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들어 주장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 측 또한 노동자의 신뢰를 얻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노사 간 대립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노조를 바라보는 두 주체간 관점의 차이도 있으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서로 간의 신뢰부족이 뿌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도요타가 노동자와 회사를 '한 축에 달린 두개의 바퀴'로 바라보는 것과 같이 노와 사, 어느 한 쪽만이 아닌 양측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발전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인 우리의 시선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노동자와 회사 모두 결국은 한명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 만큼 함께 즐거운 활동을 함께하는 것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활동을 가져보는 것과 인간존중을 기반으로 한 철학 및 모토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FDI 유치 확대를 위한 노사관계 개선'을 주제로 첫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모두들 열심히 준비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⑫ 배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최다은, 박하연, 한지훈, 김예진, 유병덕, 한윤성, 김병근, 이세현

김예진(바이오·의생명 2) : 지금부터 배재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지난 2 월 27 일에 열린 제 82 차 월례토론회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 즉 '제 2 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활성화 계획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 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낮은 투자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한국 경제가 현재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만큼, 한국경제 재도약의 핵심은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에 의한 직접투자(FDI) 촉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지난 월례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R&D 센터 육성'이 반드시 확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R&D 센터 육성으로 다시 만드는 한강의 기적'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미쓰이물산의 나카지마 토오루 사장 역시 월례토론회에서 R&D 센터를 '아이디어 상호 교류의 장'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R&D 센터 유치가 우리나라 경제성장 실현에 미치는 순기능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세현(원예조경 2) : 저는 '구글'의 R&D 센터 유치 사례를 통해 R&D 센터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거대기업 구글이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할 당시, 이를 위해 한국 내 우수 인재들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말을 하며 인력풀이 충분하면 투자규모도 더 늘리겠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우수 인력을 빼가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한국에 인재는 많은데 국가에서, 또는 국내 기업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인력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 인력의 수준을 더 높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R&D 센터 유치는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을 줄여줌으로써, 그리고 우리나라 인재들의 수준을 더 높여줌으로써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D센터는 우리나라 경제를 장기적으로 책임질 방안이다.

김범근(정치언론 3) :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R&D’ 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연구와 개발’이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당장 큰 돈이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되는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기초 공사 자금은 상당히 필요하지만 당장 이익을 뽑아낼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로 국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주가 되어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10 년, 20 년 후에 우리나라의 ‘갯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재개발의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의 먹거리, 먹고 살 수 있는 직접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R&D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한윤성(정치언론 2) : 저 역시 두 토론자 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장기화다.’, ‘두드러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없다.’ 라는 여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어 다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볼 때는 R&D 센터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범근(장치언론 3) : 그에 대해 결과물을 조사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GDP 대비 R&D 집약도가 세계 2 위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R&D 투자 관련한 순위들은 10 위권 밖에 있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이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자료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R&D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장했다.’, ‘영향력 있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두드러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예진(바이오·의생명 2) : 국가 R&D 의 높은 성공률에 가시적인 혁신적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일부 운영 중이긴 하지만, 일반 R&D 사업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예산, 사업평가 등 제도적 제약으로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국가 R&D 의 도전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포항공대에서는 지난 2011 년, 양자정보의 얽힘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양자정보기술 구현을 위한 걸림돌을 해결하여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R&D 센터 유치가 더 많이 확산된다면 학문적 성취가 높거나 공공복리 향상에 현저한 기여가 가능한 연구개발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하연(간호 2) : 과학기술부에서 07 년도에 보도한 자료를 보면 R&D 센터 유치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필요 연구원의 80% 이내를 외국인으로 충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 창출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익으로 직결된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특허, 논문과 같은 실질적인 연구에서 이익을 끌어내는, 즉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동 연구에서는 35%, 특허 출헌은 93%, 논문은 115 편, 그리고 기술 이전은 2 건, 인력교류는 187 명 등의 성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07 년도에 보도된 자료인 만큼 7 년 후인 지금은 더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예측할 수 있죠.

한지훈(영어영문 3) : 산업 활용도가 많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 역시 R&D 센터의 장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07 년도에 포스코가 파이넥스(FINEX)공법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기존 용광로 제철공법에 비해 설비투자비와 오염물질을 대폭 줄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R&D 센터 유치는 새로운 시장 형성과 혁신적인 개발을 유도해냄으로써 창조경제의 실현에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 국내 R&D 센터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김예진(바이오·의생명 2) : 지금까지의 토의를 통해 R&D 센터 유치가 다양한 순기능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R&D 센터 유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경영 4) : 1990 년대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과 기술 및 인재를 찾아 전 세계에 R&D 센터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각국은 글로벌 R&D 센터의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의 R&D 센터 유치 방안이나 계획을 조사해보았는데요.

우선 싱가포르는 바이오 관련 해외연구자 유치에 20 억 달러 지출을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은 아시아 인재들의 일본 유치를 위한 '아시아인재기금'을 창설할 정도로 유치에 관해 열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나라뿐만 아니라 2005 년 46 개국 R&D 투자 유치기관의 응답 자료를 보면 대학과의 협력촉진, 보조금 지급, R&D 장비 관세 인하 등 다양하고 파격적인 유치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규모적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과 동일하게 해나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적극적 유치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윤성(정치언론 2) : 저도 적극적 유치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한국이 추진한 유치정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시행한 '동북아 R&D 허브 전략'이 있더군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기술이전촉진법 등을 통해 부지확보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세계 일류의 해외 연구기관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창조형 국가혁신체제 구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또한 과거에는 단순히 유치 위주라는 일차원적인 사항에 그쳤다면, 지금은 양적인 확장과 더불어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제 R&D 성격도 사실 연구보다는 개발에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은 수의 R&D 센터 유치가 능사라는 일차원적인 생각보다는 '많은 수의 기여도 높은 R&D 센터 유치'를 해야 한다는 인식과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저는 중소기업 R&D 센터 유치가 이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LG 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와 같은 대기업의 R&D 센터는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업만 '밀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고치기 힘들고 어쩔 수 없는 고질병이지만 솔베이코리아의 안드레 노톰브 사장이 월례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한 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R&D 센터를 유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최다운(미디어 1) : 한국의 글로벌 R&D 센터 유치, 활용의 문제점은 주로 특정분야 편중 개발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정된 수출 자원이 변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저는 한국의 R&D 센터 유치를 위해 국내 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소 등과 연계하는 행동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비해 협력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앞서 예시로 나왔듯이 포항공대 등과 같이 수준 높은 연구를 하는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연계는 더 많은 R&D 센터를 만드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예진(바이오·의생명 2)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연구모임을 통해 R&D 센터 유치가 일자리 창출, 수준 높은 인력 양성, 산업 활용도 증가, 다양한 연구개발로 인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기대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예산이나 규모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 투자 방안들로 R&D 센터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R&D 센터의 순기능과 그를 위한 유치 방안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⑬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구미연, 황정규, 원준희, 최우석, 우한준, 김유라

김유라(심리학과 4):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시고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얘기는 지난 2 월 27 일에 열린 제 82 차 월례토론회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를 대주제로 하여 강원대 학생들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즉, FDI 를 위해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 대학생의 입장에서 토론을 하여 지적 교류를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한국 GM, 솔베이 코리아, 미쓰이물산, 그리고 ADT 코리아가 등 국내에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현실에서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 기업 CEO 분들께서는 한국의 노사관계와 임금, 정책의 비 일관성 그리고 잦은 세무조사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 대해서 어떤 점을 고쳐야 좋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한준(경영학과 4):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 있어서 문제점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도 많은데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엘지 전자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다른 새로운 신규 회사들이나 벤쳐 기업들의 기업 생존도가 굉장히 낮은 점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기사 중 하나는 '한국은 실패에 대한 용의성이 굉장히 적은 나라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웃으며 하는 얘기 중 하나지만 '빌 게이츠'는 그냥 하나의 컴퓨터 팬이 될 수 있었고 페이스북의 '마크 쥬커버그'도 평범한 하나의 해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용의성도 없고 도전정신도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법규 내에서 자신의 기업을 크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잘 이용을 하고 있고, 기업들 간의 빈부격차가 큰 상태이며 너무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정규(경제학과 4): 우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2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조업의 수출 신장에도 하락하는 잠재 성장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스타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취약한 기업 생태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1980 년대의 성장률은 평균 9.7%였으나 1990 년대에는 6.6%, 2000 년대 중반까지는 4.7%, 그리고 최근 5 년에는 평균 2.9%로서 마치 계단을 뛰어 내려가듯이 하강 추세가 뚜렷합니다. 여기서 저 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합치면 잠재성장률은 0 프로 이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에서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이후에도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이렇게 제조업의 수출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직접, 간접 설비 투자는 증가되고, 고용 소득이 증대되어

내수 확대의 선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1991 년 대비 413%의 제조업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오히려 제조업에 대한 고용은 20%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인 중 하나는 전투적인 노조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력의 절감으로 자칫 기업은 공장을 자동화로 돌리거나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보다 해외에서 투자하여 해외에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생산방식을 바꾸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해외 직접 투자의 3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편차가 심하다 입니다. 중소기업은 정부로서의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중기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며 그들의 사업영역을 대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추가 지원하는 정책은 자칫 중소기업 안주성향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빚는다고 생각합니다.

우한준(경영학과 4):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대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도전을 한다면, 이미 기반을 자리잡고 있는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업에서는, 실제로 창업하는 기업들 중 3 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이 10%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뒷받침하는 정책이 이뤄진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나가기 보다는 중소기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석(경영학과 3): 여러 가지 문제 중 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혁 측면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유 경제체제에 의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요즘 세계의 추세가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금마저도 통상임금을 확대시키고 최저시급을 올리다 보니까, 시장에 맞게 움직이기보다는 국가의 간섭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보기에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한국에 오면 왜 이렇게 규제가 많지?'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 CEO 들은 일하는 것에 반, 노조에 반으로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기업이 노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정규(경제학과 4): 근데 노조에 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에 의해서는 개인은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디에 의지를 해야 합니까?

최우석(경영학과 4): 기업이라는 게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정해지면 좋겠지만, 저도 시장경제주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대우를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흐름 자체가 한국보단 중국 노동이 싸고 미국보단 한국 노동이 싸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도 잠재성장력이 낮다는 것은 한계가 왔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창조경제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더 이상 싼 노동에 의지하기 보다는 창의력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어떻게 보호를 해주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항상 정부가 말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방식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규(경제학과 4): 지금 이렇게 우리 나라의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것 못입으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기업은 그만큼의 희생으로 인해 얻어진 수입을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쥬'가 있잖습니까? 하지만 저는 한국 신문에서 이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최우석(경영학과 4):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이나 프랑스는 천천히 계단을 밟고 성장했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세우는 데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나라만의 알맞은 방법을 이룩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라(심리학과 4): 한국 대기업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출시하는 제품들을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과 다르게 한국은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으니,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외국의 사례가 있다면 덧붙여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창조경제'라는 것이 적은 투자로 큰 산출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내는 창의성에 대해서 비난과 질책을 하는 자세보다 응원해주고 복 돋아 주는 자세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원준희(생물의소재공학과 5):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의 기업을 모방하여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삼성은 소니, 노키아, 도시바를 벤치마킹 하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전세계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에 비춰 보면 더 이상 선진국 따라 하기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ict 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정책적 아젠더를 성공시키는 것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겠죠?

산업과 사회, 기술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업을 만들어 가는 '기업가 정신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갖가지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과 각 대학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에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비해 질과 양적인 면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대학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의 61 개 link 사업 대학과 중기청의 창업 선도대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은 15 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학생의 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젊은이들의 창업기피 현상이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업가 정신교육 체계를 살펴보면 1998 년 1 인당 국민소득 2 만 달러에 정체되어 있을 때 유수대학이 기업가 정신 교육과정을 정신교과목으로 채택해 젊은이들에게 혁신적인 창업가 정신을 교육했습니다. 그 결과, 90 년대 중반 미국의 국민소득 3 만 달러로 높아졌으며 이제는 현재 4 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가 정신교육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어지는 기업가 정신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게임을 통해서 창업교육을 하고 초, 중, 고등학교 때에는 각 단계에 맞는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꿈꾸며 성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청소년 전주기에

걸쳐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체계 면에서 우리와 아예 다릅니다. 나이 30 세에 200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 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도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배출되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을 우리나라가 갖춰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연(정보통계학과 4): 저는 선진국의 선진교육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교육기관 및 해외 유학생 유치 등 의료서비스에서는 해외환자 유치, 의료시스템 수출을 하는 등 새로운 내수시장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은 창업교육의 하부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어렸을 때부터 창업과정을 개설할 정도로 창업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몬타 비스타'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사업 구성안을 짜고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은 저작권, 특허 등록을 하고 실제 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창업교육이 활발히 일어난다면 창조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석(경영학과 4): 제가 의료부문에 대해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요새 정부와 의사협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도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격의료를 하자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큰 병원밖에 살아 남을 수 없다고 불만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김유라(심리학과 4): 최우석 학우님, 주제에 벗어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우석(경영학과 4): 아까 구미연 학우께서 외국의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의견이라 주제에 벗어나는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연(정보통계학과 4): 의료 행위라는 것은 원격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동영상강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원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을 갈 수 없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입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석(경영학과 4): 간단하게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의사 협회에 대한 파업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한준(경영학과 4): 제가 만약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유명한 의사가 있는 큰 병원과 동네에 있는 개인병원 중 당연히 큰 병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원격 진료와 원격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수술하느냐 기계가 수술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원격 의료가 진행 된다면, 강자만이 강해지는 상황이 초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가 아이디어를 중요시하는 것이라면, 창조경제가 굉장히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 제조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독일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갖고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 수리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D 업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외국에서는 가장 높은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가 좀 더 높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정규(경제학과 4): 그렇다면 블루칼라가 되기 위해 썼던 기회비용 예를 들어, 시간과 돈에 대해서는 무시하자는 것인가요?

우한준(경영학과 4):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다른 뒷받침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누가 더 나은 대우를 받느냐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자를 3D 업종이라 하여 꺼리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그에 대한 튼튼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없이 창조경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조경제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의식부터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황정규(경제학과 4):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미국에서 유명 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등 실리콘 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델라 웨어 주'에 설립되어 '델라 웨어 주 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50 개의 회사 법 중 자신이 마음에 드는 법을 선택하여 회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경영권을 안정시켜주는 차등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IPO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회사가 IPO 를 할 때 그 회사의 경영권에 위태로움을 느낀다면, 상장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차등의결권 같은 법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기업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분에 의해서 외국기업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자신이 추진하려는 사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는 것, 기업이 원하는 일을 펼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이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최우석(경영학과 4):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R&D 개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발을 하려면 외국의 많은 CEO 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잠재성장력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발전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회계가 일관성 없이 매번 달라진다고 합니다. 회계의 일관성이 있어야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믿으며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라(심리학과 4): 우리나라의 현재 기업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교육과, 교육과 의료에 대한 창업교육, 기업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법제도 확립과 회계에 대한 일관성과 법의 규제 완화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조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슨 행동을 먼저 하기보다는 위에서 말했듯이 기업가 정신과 같은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세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믿겨지나요? 저는 아직도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살았는지 동영상을 보고 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비록 압축성장으로 부족한 점도 많지만, 개선해야 할 점을 인식하여 고쳐나가면서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것이 아닌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⑭ 군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현경, 정자연, 문성현, 정상운, 노미영

김현경(해양 4) : 지금부터 군산대학교 1 차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차 연구모임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2 월 27 일 82 차 월례토론회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금융위기(IMF) 이후 한국이 가진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치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침울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5 년 간(2007 년~2013 년) 외국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1/3 만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GDP 대비 낮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이하 FDI) 유치를 촉진해야 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기업은 왜 투자율이 낮은가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한국이 바꾸어야 할 환경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82 차 월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4 명의 외국인 CEO 분들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제는 낙관적이나 FDI 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브래드 벅웰터(ADT 코리아 사장)는 '노사 간의 신뢰'를, 세르지오 호샤(한국 GM 사장)는 '노사간의 이해조정'을 언급하시며 한국의 노동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해주셨고, 나카지마 토우로(한국미쓰이물산 사장)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안드레 노톰브(솔베이코리아 사장)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시며, 협력에 대한 창조적인 융합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4 가지 다양한 의견 중 저는 브래드 벅웰터(ADT 코리아 사장)의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야 할 기업의 환경에 대한 주제로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한국기업환경에서 신뢰를 통한 노사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정자연, 문성현, 정상운, 노미영

정자연(사학 4) : 저는 기업환경이 필요한 것이 신뢰라는 것 이전에 관계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당연한 사실을 단순히 신분구조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품앗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집에 가서 도와주고, 품삯으로 다음에 우리 집 일손이 부족할 때 도와주며 지금은 노동자의 입장일지 몰라도, 다음에는 피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서로 도와준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궈낸 우리 선조들의 좋은 제도입니다.

부락 사회에서 서로 간의 정으로 이어진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제도는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처럼 관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보다는 노사간의 신뢰 속에서 기업성장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 관망합니다.

김현경(해양 4) : 정자연 학우는 관계에 있어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며, 옛 선조들이 품앗이라는 제로를 사용했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학우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영(영어영문 4) : 저는 정자연 학우가 이야기했던 것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덧붙여서 관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신뢰라는 것은 어떤 관계든지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개인적인 인성과 성품에 깃들어 있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호 간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으며 즉, 소통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인 시위를 기사나 현장목격을 통해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내는 한가지 방법이지만, 일방적인 호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일련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다 결국 노동자에게 시위라는 수단을 쓰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노동자와 소통을 통한 교류를 만들기 위해 기업내의 신문고와 소리함 등,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사관계의 신뢰는 소통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경(해양 4) : 노미영 학우는 정자연 학우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통을 들면서 기업이 노동자의 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실제로 겪었거나 주변에서 일어난 사례가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성현(영어영문 4) : 제가 제과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주 5 일 오후에만 일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용무에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일손이 더 필요할 때마다 저를 부르셨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책정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할 처지가 못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아는 사장님은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노동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만약 노동과 상응하는 임금을 매겨주셨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의 대가에 상응하는 임금을 책정시켜 주시고, 약속한 일수에 맞추어 일을 했더라면 필요에 의한 관계가 서로에게 충족되며 잘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신뢰라는 것은 임금을 기본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노미영 학우가 언급한 시위라든지, 파업이 일어날 때에는 임금문제를 축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임금에 대한 노사 간의 신뢰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노미영학우가 언급한 부분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경(해양 4) : 문성현 학우는 개인적인 사례를 덧붙여주시면서 시위와 파업의 근본적인 문제로 임금이 있던 것으로 보아 노사관계의 신뢰는 임금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통이라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개인마다 소통의 기준이 다르고,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운(무역 4) : 저도 임금이 신뢰를 구축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주와 노동자는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통상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노동자는 자신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여 서로 노사라는 입장에서 관계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제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노사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 간의 만족을 채워주며 일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월례토론회에 참석하신 ADT 코리아에서는 사업적인 부분에 신경을 더욱 씀으로 인해 기업의 성장에 잇따른 정당한 임금을 부여하며 노사간의 신뢰를 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기업을 일궈내는 느낌을 주면서도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을 추구하게 만들며, 이에 따른 성과를 인정하여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이고도 만족적인 임금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상호 간의 신뢰는 높아지는 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선순환적인 활동은 기업자체 경쟁력을 높여서 FDI 유치에도 높은 성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사간의 신뢰는 약속입니다.

김현경(해양 4) : 정상운 학우는 문성현 학우에 이어 다시 한번 임금에 관한 신뢰를 언급해 주시면서, ADT 코리아의 기업 성장 분석요인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노사간에는 상호 간의 배려와 인정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면 FDI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1 차 연구모임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예부터 내려온 품앗이라는 제도를 계승하여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이는 소통을 통해 형성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통과 신뢰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서 보완하여 서로 상호 간에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요소로도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토론자 여러분께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노사 간에 있어서는 임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업과 노동자간의 임금의 만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기업내의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성장이 필요하고, 이 결과로 FDI 유치 또한 바라볼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⑮ 공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 위부터 심성보, 김현기, 안순철, 양인모

심성보(공주대 화공 3) : 먼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메일로 초청장과 토론문을 보내드렸듯이 지난 2 월 27 일,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에 대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7 년간 연평균성장률이 2.9%를 기록하여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장기 경기침체 징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조심스러운 회복기조로 들어서는 올해 한국경제는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고 성장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글로벌 기업의 본사 및 R&D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글로벌 전략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기업의 R&D 센터 설립은 신규 R&D 센터 자체를 세울 뿐 아니라, 기존 국내 R&D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투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 잠재력은 세계 4 위이지만 전체적인 투자 순위는 세계 31 위이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센터는 8 개에 불과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을 가장 원인이라고 말했으며 이어서 경제변수의 변동성, 규제수준 과도, 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 등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오늘 토론 시간에는 규제수준 과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과도한 규제에 따른 피해사례를 전체적으로 듣고 그 후에 해결방안을 생각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김현기(공주대 화공 4) : 저는 환경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은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29.6%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불시에 방문하여 실수에 의한 사소한 위반조차도 엄격한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 소재한 L 사는 환경법을 준수하기 위해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증축해야 하는데 대지 3000 평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조례로 인해 짓지를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H 사 공장에서는 법 규정대로 환경관리를 하려면 10 여명의 관리자가 필요하지만 그리 크지 않는 중소기업 규모에서는 3 명 정도 밖에 운영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성보(공주대 화공 3) : 환경 규제에 따른 기업의 투자 피해 사례로 L 사는 창고 증축을 위해 대지 3000 평이 필요하다는 규제에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쳐서 보관하고 있는 사례와 강원도 H 사는 법 규정에 의해 환경 관리자가 10 명이 필요하지만 공장 실정에 따라 3 명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사례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환경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떠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주실 분 있나요?

안은별(공주대 화공 4) : 저는 SK 종합화학이 JX NOE 와 합작 2 조 3 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공장 설립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SK 종합화학과 JK NOE 는 울산에 연산 100 만 톤 파라자일렌 공장 설립과 제 3 윤활기유 공장 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증손 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증손 회사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원천적으로 가로막혀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SK 종합화학이 JX NOE 와 합작 2 조 3 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공장 설립은 미뤄졌습니다. 투자는 시기가 중요하여서 적기의 투자시기를 놓치면 중국 등 다른 국가에게 사업 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 이 사례는 손자 회사가 증손 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 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외국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양인모(공주대 화공 3) : 저는 규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를 잃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D 사는 독일계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첨단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수도권 입지규제(500 ㎡ 이상 증설 금지) 등으로 인해 첨단 생산품목 생산을 위한 공장증설 투자가 불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투자되어야 할 생산시설이 중국으로 이전되어 연간 40 만대 가량 매출을 잃었습니다.

심성보(공주대 화공 3) : 마지막으로 수도권 입지 규제에 따른 독일계 외국인투자 기업이 발길을 중국으로 돌린 사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김현기 학우가 언급한 환경 규제에 따른 기업의 투자 피해 사례와 양인모 학우가 언급한 수도권 입지 규제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잃은 사례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먼저 김현기 학우가 언급한 환경 규제에 따른 기업의 투자 피해 사례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현기(공주대 화공 4) : 앞에서 제가 언급한 사례를 보았을 때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증축해야 하는데 대지 3000 평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과 공장에서는 법 규정대로 환경관리를 하려면 10 여명의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규제를 보았을 때 너무 막연하게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기업에서는 3 명의 환경 관리자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규정에 따라 10 명을 배치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나 환경 관리자의 인원을 기업의 사업 규모에 맞게 차등적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은별(공주대 화공 4) : 김현기 학우가 말한 것처럼 차등적 규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이 환경오염을 일으켰을 시에 처벌을 높여서 기업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 년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 년 공주시 의당면에 위치한 창만축산 도계장은 오·폐수 최종방류 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오·폐수를 정안천과 금강으로 방류했습니다. 이 도계 장은 수차례 단속에 걸렸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주변 환경과 금강의 수질오염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은 더 큰 화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처벌은 강화시키는 것은 기업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써 이것이 강하다고 해서 기업이 불만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김현기 학우가 제시한 차등적 규제를 통해 투자는 늘어나게 되더라고 처벌의 강화를 통해 공장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성보(공주대 화공 3) : 안은별 학우는 환경오염을 일으켰을 시에 처벌을 강화해서 기업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환경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공장입지가 불가능할 경우 투자를 유보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현상은 경제 개방의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인모 학우가 언급한 사례도 수도권

입지 규제에 따른 독일계 외국인투자 기업이 발길을 중국으로 돌린 사례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양인모 (공주대 화공 3) : 영국은 1930 년대 후반부터 과밀한 런던 지역의 집중완화와 낙후된 북부 공업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수도권정비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개발 규제가 경쟁력 향상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유럽 내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런던을 영국경제의 경쟁력 회복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0 년대 들어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이 본질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은 세계도시 런던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모범적인 지속가능한 세계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런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국적기업 유치 등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업무공간의 공급 확대와 인구증가를 수용하기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 그리고 교통과 공공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인구와 산업입지 억제정책을 포기하고 경제성장과 인구유입을 받아들이되 성장의 과실을 재원으로 교통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런던계획 London Plan 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런던계획은 영국 지역계획의 새로운 사례로서 토지이용 및 개발을 교통 및 기타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및 공동체 개발 등과 통합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런던계획의 공간전략은 대규모 기존 개발지역과 런던 중심부의 고밀도화, 접근성이 높은 일부 런던 외곽지역의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은별(공주대 화공 4) : 우리나라 인구 성장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수도권 집중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990 년대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며, 현재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004 년 현재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인구증가율의 감소추세가 더욱 뚜렷합니다.

경기지역의 인구증가율은 1990 년대 초반 급격히 감소하다가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2 년부터 2004 년 현재까지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권 인구비중은 높지만, 인구집중현상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심성보(공주대 화공 3) :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망설이게 하는 규제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규제들로 인해 발생한 사례를 통해 현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환경 규제와 수도권 입지 규제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였으며 환경 규제 의 문제점으로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증축해야 하는데 대지 3000 평 이상이 되어야하는 것과 환경 관리자가 10 명이 되어야 한다는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규모에 맞지 않게 규제를 맞춰야하기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등적 규제와 환경 오염을 일으킬 시 처벌의 강화를 통해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입지 규제의 문제점을 독일의 D 사가 투자를 중국으로 돌린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해결방안으로는 영국의 런던 사례를 들어서 중심 도시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모범적인 지속가능한 세계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뒷받침하여 서울의 경우 1990 년대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수도권 인구비중은 높지만 인구집중현상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을 제시하면서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자료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것과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⑯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장윤석, 황단비, 최무성, 전미래, 한범희

장윤석(신문방송 4) : 지금부터 원광대학교 1 차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차 연구모임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2 월 27 일 82 차 월례토론회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요인이 안으로 들어오는 성장요인보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성장요인이 3 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요인이 빠져나가다 보니 외국기업 CEO 들은 대한민국에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문제점으로 82 차 월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브래드 벅월터(ADT 코리아 사장)는 "노사간 신뢰를 확립한다면 사측은 임금 인상률 등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할 필요 없이 비즈니스 전략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노사관계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세르지오 호샤 (한국 GM 사장)는 한국의 노동 경쟁력 약화를 문제로 꼽으면서 특히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등을 제시해 주셨고, 나카지마 토우로 (한국미쓰이물산 사장)는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의 문제점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는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외국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법령 폐기를 주장해 주셨습니다.

4 명의 외국인 CEO 들의 의견 중 저는 브래드 벅월터(ADT 코리아 사장)의 신뢰를 통한 노사관계를 주제로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신뢰를 통한 노사관계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래(신문방송 3): 저도 한국기업의 문제점 중 가장 시급하게 보안되어야 할 것이 노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신뢰를 통한 노사관계에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대학 교과과정 중 노사관계론 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노사관계론 수업의 과제를 하면서 2012 년 1 월 현대차 노동자 분신파업 이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노조원이 분신을 하게 된 이유는 노조와 경영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기사를 접하고 과제를 하면서 저는 신뢰를 통한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영자와 노동자 간에 소통은 많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장윤석(신문방송 4): 전미래 학우는 신뢰를 통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학우 분들의 의견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성(신문방송 4): 저는 이번 연구모임을 준비하면서 신뢰를 쌓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존중의 실천, 준법정신의 함양,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존중의 실천은 노사 모두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준법정신의 함양은 노사 모두가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선 안 되고, 노조는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의 합리적 해결은 노사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힘보다는 마음으로 분쟁을 해결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지켜주면 신뢰가 쌓이고 더욱 합리적이고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미래(신문방송 3): 저도 최무성 학우가 해결책을 제시해준 세 가지 방안중 준법정신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있듯이 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신뢰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윤석(신문방송 4): 최무성 학우는 인간존중의 실천, 준법정신의 함양,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같은 기본적인 방법을 적용해 신뢰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밖에 실제로 내가 겪었거나 주변에서 일어난 사례가 있다면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한범희(신문방송 4): 주변에 카페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임금문제였습니다. 이 친구는 한 달 동안 일한 대가가 90 만원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생각 만큼 안되고 바쁘지 않으니 60 만 원의 돈만 챙겨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일을 그만두고 사장과 서로 얼굴을 붉히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아까 최무성 학우가 언급했던 준법정신의 함양이 공감이 가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신뢰적인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임금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파업을 한다는 뉴스나 기사를 볼 때면 임금인상 문제로 노사간에 줄다리기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계가 바로 잡혀있는 것이 신뢰를 통한 노사관계라고 생각되어지네요.

황단비(행정 3): 맞아요, 저도 임금체계가 기본적으로 바로 잡혀있어야 신뢰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열제보다는 성과제를 통한 임금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열제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 들어온 신입들은 의욕도 없어지며 발전적인 기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석(신문방송 4): 한범희 학우와 황단비 학우는 임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신뢰적인 노사관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황단비 학우는 기업의 경우에는 서열제보다는 성과제를 통한 임금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방안을 내주었습니다.

황단비(행정 3): 실제로 대성산업가스의 경우를 보면 2000 년도부터 시작된 노사의 갈등과 불신은 이후 6 년 간 파업 4 회, 파업일수 70 일, 2 년 간의 조정신청 기간 등 투쟁과 대립적인 최악의 노사관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발전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 하면서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노사가 힘을 합치기 시작 하면서 2006 년 노사 평화 공동선언 채택과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선정 시행 등을 통해 2006 년부터 7 년 연속 무분규 타결 사업장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평균 21 회의 노사교섭 횟수를 ‘07 년 이후 3 년간 7 회, ’10 년 이후 5.5 회로 감소 시킴에 있어서 매년 임·단협 시 노사합의에 의해 당해 연도 성과 배분액 금액 및 기준 등을 결정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 시 전사원 포상제 실시함으로써 작년 한해 총 142 건의 노사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장윤석(신문방송 4): 황단비 학우는 다시 한번 성과 배분액에 관해서 거듭 언급해 주었습니다. 덧붙여 목표 달성시 포상제를 실시함으로써 노사교섭의 횟수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을 이어 주셨습니다.



신뢰를 통한 노사관계

제 1 차 연구모임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자면 신뢰를 통한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해선 최무성 학우가 의견을 내세운 기본적으로 인간존중의 실천, 준법정신의 함양, 분쟁의 합리적 해결이 신뢰적 노사관계가 되기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가지 기본적인 실천 중 조원들은 준법정신의 함양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법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을 해주었습니다. 노사 간에 최소한의 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체계도 법에 따라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사 간에 법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법을 지키면 신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노사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을 통해 신뢰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환경도 개선됨과 동시에 기업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성장요인이 적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안으로 들어오는 성장요인 또한 많아질 것이며 외국기업 CEO 들의 인식또한 바뀔 것입니다.

선진화 과제 26:

20 대 국회에 바란다

(제 102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권순형(서울대학교 경제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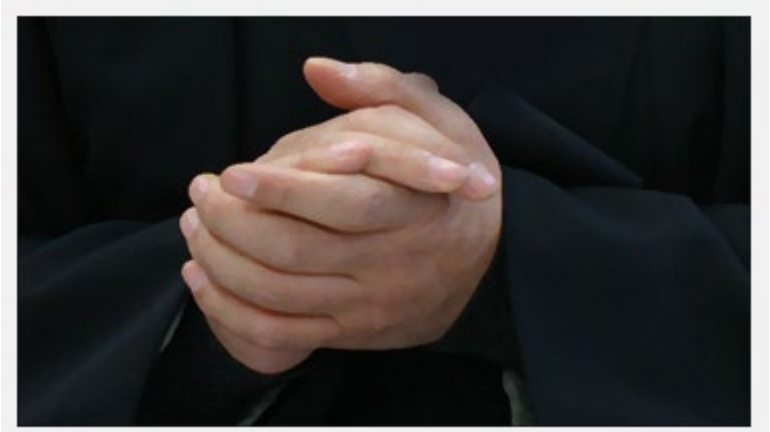


오는 6 월 20 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의 전문가들이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짚고 20 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논의하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28 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 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10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정근 교수는 "20 대 국회는 중장기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양적팽창 정책과 함께 과감한 구조조정, 사업개편, 구조개혁, 규제혁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혁파해야 할 규제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규제혁파에는 너무도 많은 저항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개원 초기 국민공감대를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화순 교수는 20 대 총선 당시 여야의 정책 공약들을 분석하고 "총체적 시각과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되어 있고, 정책들이 조화롭지 못하며 정치적 타협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회정책은 정치적 갈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 3 의 전문적 논의기구를 통해 직접적인 정치 갈등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의 문제는 '대립쟁점'이기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합의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새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옥남 정치실장은 “20 대 국회는 우선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중 상시국회 운영제도 도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괴리가 있는 현 국회의 세비 책정 법적 근거 및 운용 투명성 확보, 국회의원 특권 제한, 극회윤리위원회 활동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영 교수는 “20 대 국회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글로벌 문화경쟁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에 한류문명의 발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다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한류문명을 발화시키기 위해 문화 중산층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군소도시까지 전파될 수 있는 문화신경망 시스템인 '풀뿌리 문화신경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토인비는 인류문명을 크게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으로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물질문명은 충분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경제개발과 근대화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신문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공허하다면 개인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신문명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신문명은 곧 문화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 대 국회는 우리나라를 문화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공동체 정신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먼저 문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한경쟁주의에 빠져있습니다. 물질문명에 몰두한 덕분에 대한민국은 빠르게 절대빈곤에서 탈출했지만, 지금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공동체는 붕괴했습니다. 사회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허한 정신을 문화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문화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부각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흔히 중산층만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이란 '행복한 삶에 대한 하나의 사회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중산층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소득, 풍요로운 소비 등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에 대한 이러한 획일적인 정의는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사회는 '콩 한 쪽도 빼앗으려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문화 중산층', 이제 문화를 즐기는 게 행복한 삶의 척도!

실례로, 어떤 생산직 노동자들은 1 억 원이라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 60 시간을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주일 내내 일만 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다른 이들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가족도, 여가활동도 없이 돈만 악착같이 벌려고 하는 세태는 정신적으로 공허하여 무한경쟁만 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산층의 개념에 문화사회적 기준을 추가하여,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누구나 전통풍속, 인문예술, 스포츠를 즐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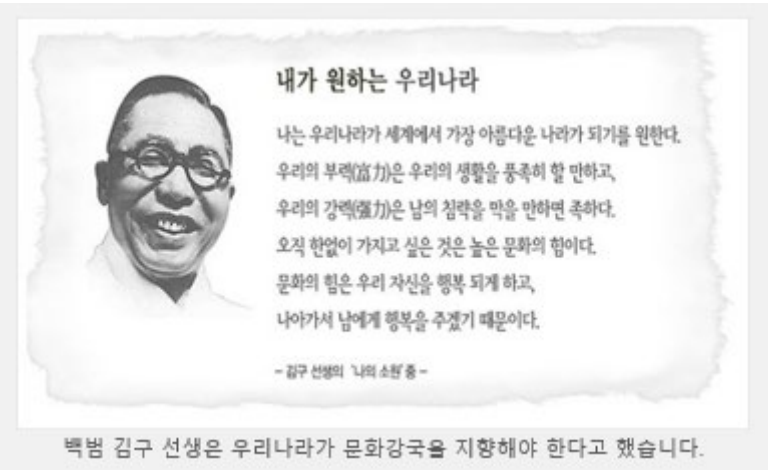
가령, 프랑스는 중산층을 '1 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스포츠 활동, 악기 연주능력,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과 같은 기준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사회에서의 행복한 삶의 기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00 년이 넘도록 일요일 영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 주말에는 가족이 모여 삶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정책의 확대를 통해 비상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

많은 이들이 문화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 중산층'의 강조와 더불어 국민들의 문화향유 실태를 조사하는 일종의 '문화센서스'를 실시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초중고 문화교육을 개편하고 문화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나라는 금방 문화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문화 활동에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이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센서스를 통해 각 계층들의 문화 수요를 파악한다면, 지금의 문화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에게도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며,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나라로 문화강국을 제시했습니다. 강력한 힘만 가진 나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는 인류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20 대 국회는 대한민국이 이처럼 아름다운 문화의 힘, 높은 문화의 힘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② 김주영(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월 30일부터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지난 28 일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 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하로 10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오는 6 월 20 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의 전문가들이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짚고, 20 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능하고 실적 없는 국회로 낙인찍힌 19 대 국회가 5 월 말 임기를 종료하고 20 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정치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피력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병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에는 오정근 건국대 금융 IT 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대영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나섰습니다.

오정근 교수는 "20 대 국회는 중장기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구조개혁, 규제혁파,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혁파해야 할 규제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규제혁파에는 너무도 많은 저항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개원 초기 국민공감대를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조화순 교수는 20 대 총선 당시 여야의 정책공약들을 분석하고 "총체적 시각과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돼 있고, 정책들이 조화롭지 못하며, 정치적 타협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정책은 정치적 갈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 3 의 전문적 논의기구를 통해 직접적인 정치 갈등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의 문제는 '대립쟁점'이기 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합의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옥남 정치실장은 "20 대 국회는 우선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중 상시국회 운영제도 도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괴리가 있는 현 국회의 세비 책정 법적 근거 및 운용 투명성 확보, 국회의원 특권 제한, 국회윤리위원회 활동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20대 국회를 향한 목소리를 냈다.

이대영 교수는 "20 대 국회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글로벌 문화경쟁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에 한류문명의 발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다듬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한류문명을 발화시키기 위해 문화 중산층을 강화하고,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군소도시까지 전파될 수 있는 문화신경망 시스템인 '풀뿌리 문화신경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점점 경제수준에 비해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정신문화의 발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는 공동체 구성원의 미래의 꿈을 현실로 그려내는 화실이자 공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해 언어, 사회문화, 풍습 등 분단 70 년 동안 체제를 달리하며 균열된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통일운동이 필요합니다.



통일 한국을 위한 문화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이 된다면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에 따른 문제 뿐 만 아니라, 문화적 격차로 인한 갈등 및 사회적 문제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사전에 문화통일을 위한 학술 연구 활동 지원 및 교류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남·북한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효과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통일한국'이 미래에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촌 한류문화벨트를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 역시 있습니다. 연구가들의 해외 한인 연구 및 세종학당의 예산 확대 등 문화외교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통일 한국을 내다보며 정신적인 토대를 닦는 작업이 20 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다면 통일 후 발생할 여러 혼란들을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에게 판단의 기준이 가치관이듯 국가와 민족에게는 문화가 행동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발전적인 20 대 국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③ 김주헌(영남대학교 국사학과)



많은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대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는 6 월 20 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4 월 28 일 서울 중구 명동은행회관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의 전문가들이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짚고, 20 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논의하기 위해 '20 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제 102 차 월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정근 교수는 "20 대 국회는 중장기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개편, 구조개혁, 규제혁파,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 교수는 혁파해야 할 규제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규제혁파에는 너무도 많은 저항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개원 초기 국민공감대를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조화순 교수는 20 대 총선 당시 여야의 정책 공약들을 분석하고 "총체적 시각과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돼 있고, 정책들이 조화롭지 못하며, 정치적 타협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조 교수는 "사회정책은 정치적 갈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 3 의 전문적 논의기구를 통해 직접적인 정치 갈등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의 문제는 '대립쟁점'이기 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합의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대 국회,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다음으로 이옥남 정치실장은 "20 대 국회는 우선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중 상시국회 운영제도 도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괴리가 있는 현 국회의 세비 책정 법적 근거 및 운용 투명성 확보, 국회의원 특권 제한, 극회윤리위원회 활동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영 교수는 "20 대 국회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글로벌 문화경쟁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에 한류문명의 발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다듬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한류문명을 발화시키기 위해 문화 중산층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군소도시까지 전파될 수 있는 문화신경만 시스템인 '풀뿌리 문화신경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준통합은 작은 것 부터 점진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

분단 70 년이 지난 지금, 분단의 고착화가 되지 않기 위해 국회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남북의 표준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통일 후 10 년 간 77 조~350 조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며 RAND 연구소는 50 조~670 조라는 한반도 통일비용이 나올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서독 역시 통일비용으로 1 조 마르크(약 400 조원)을 예상했지만, 1990 년 통일 후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분단이 된 상황에서도 방송 표준 등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표준 통일 비용은 180 조 원이 소요되어 전체 국가 통일 비용의 약 10%나 들었다고 합니다.



표준 통합은 한반도 통일에 큰 시너지 역할로 작용한다

이러한 표준 통합의 논의는 남북 간에도 있었습니다. 1991 년 12 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타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1992 년 9 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3 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산업표준의 교류에 대하여 남북 당국자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11.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 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1992)"

이러한 표준 협력 및 표준 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의미와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통일 이전 표준 협력 증대를 통한 통일 비용 저감, 인문사회적 표준 통합을 통해 통일 후 사회통합을 촉진, 국제 표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우호적 국제 분위기 조성, 신속한 표준 통합을 통해 통일 한국의 경제발전 촉진, 신속한 국제표준 부합화를 통해 통일 한국의 국제 위상 제고 촉진" 등이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표준 통합보다 더 중요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 등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합을 위해 남북 표준 통합을 이루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자료
사진 3 : 연합신문
사진 4 : 통일부 블로그

④ 김한슬(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난 4월 13일 총선으로 오는 6월 2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오는 6 월 20 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의 전문가들이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짚고, 20 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월 28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20 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하로 10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19 대 국회가 5 월 말 임기를 종료하고 20 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정치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피력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제 분야: 국민공감대 토대로 적극적 구조조정, 구조개혁, 규제혁파 등

오정근 교수는 "20 대 국회는 중장기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구조개혁, 규제혁파,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혁파해야 할 규제의 종류을 나열하면서, "규제혁파에는 너무도 많은 저항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개원 초기 국민공감대를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분야: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조화로운 정책 합의 이루어져야

조화순 교수는 20 대 총선 당시 여야의 정책공약들을 분석하고 "총체적 시각과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돼 있고, 정책들이 조화롭지 못하며, 정치적 타협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정책은 정치적 갈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 3 의 전문적 논의기구를 통해 직접적인 정치 갈등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의 문제는 '대립쟁점'이기 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합의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 분야: 통일 시대 준비, 한류 위한 법적 기초 다듬기, 풀뿌리 문화신경망

이대영 교수는 "20 대 국회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글로벌 문화경쟁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에 한류문명의 발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다듬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한류문명을 발화시키기 위해 문화 중산층을 강화하고,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풀뿌리 문화신경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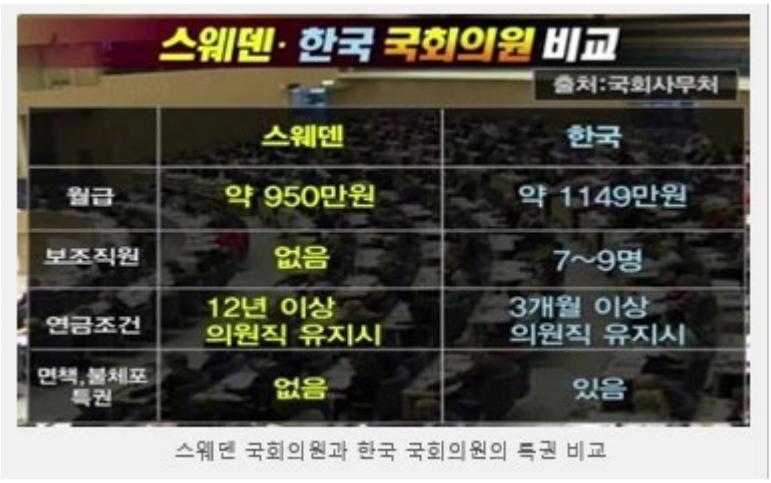


정치 분야: 국가 정체성 지키기,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 분야 변화 촉구.

이옥남 정치실장은 "20 대 국회는 우선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 연중 상시국회 운영제도 도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3) 현 국회의 세비 책정 법적 근거 및 운용 투명성 확보 (4) 국회의원 특권 제한 (5) 국회윤리위원회 활동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 핵심특권은 6 가지 분야에 걸쳐 총 31 가지 항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 준법, 공직선거, 세비, 잇속 챙기기, 기타 분야에서 다양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요.

공항 VIP 실 이용, 아무런 기여 없이도 급여와 혜택을 누리는 것,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 특수활동비 등의 특권은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회 특권은 행정부나 사법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스웨덴 국회의원과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 비교

이처럼 특권이 많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스웨덴 등 북유럽의 국회의원과 종종 비교 되곤 합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그들의 국회의원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정치인', '적은 월급에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미안해하고 고마워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의 2 배 이상을 일하며 국회는 1 년 내내 문을 닫지 않습니다. 매일 국회로 출퇴근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은 관용차나 차량유지비를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퇴근합니다. 개인보좌관이나 비서관도 없지만 의원마다 발의안수는 임기 중 평균 100 여 건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월급도 한국 물가로 600 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스웨덴은 국회의원 1 인이 대표하는 인구가 평균 약 27,000 명인데 반해 한국은 국회의원 1 인이 약 167,400 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1 인당 갖는 책임과 업무량이 스웨덴의 국회의원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스웨덴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스웨덴 인구의 5 배가 넘지만 국회의원의 수는 스웨덴보다 50 명 가량 적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의 수를 인구에 비례하여 늘려 국회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 권력을 나누어가지는 것을 고려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중선거구제로의 법개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20 대 국회에게 바라는 점은 당선인들 스스로가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고 윤리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자정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선거 운동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모시는 봉사정신'으로 특권의식 내려놓기

아무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등의 감시제도를 확대한다고 해도 국회의원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감시망을 뚫고 과도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 시의 마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특권의식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도올 선생은 20 대 총선을 "젊은이들의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천안문 사건을 통해서도 민주주의를 따내지 못했고 오직 개혁개방이라는 사탕을 따냈을 뿐이지만 우리는 광주민주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였습니다. 이처럼 힘들게 따낸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는 듯하자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한 번 항쟁에 분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적은 월급에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인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이 늘 미안해하고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고 칭찬하고 존경할 수 있다면 20 대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 대 국회, 국회가 20 살이 됩니다. 20 살은 불안한 미래에 흔들리지만 새로움과 도전정신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대 국회도 경제, 정치 등 여러 분야의 불안함에 직면하고 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겸손함과 자신감, 도전정신으로 어려움을 하나하나 넘어서길 바라봅니다.

1: peoplepower21.org
5: ohmynews.com
7: news.jtbc.joins.com

⑤ 김효원(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다가오는 6 월 20 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의 전문가들이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짚고, 20 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논의하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이 '20 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10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오정근 교수는 "20 대 국회가 중장기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하며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구조개혁, 규제혁파, 신 성장 동력 산업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방향, 지원방식, 사후대책 등 큰 그림만 그리고,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전문가가 전권을 가지고 추진해야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정근 교수는 혁파해야 할 규제로 행정부처 규제 당국의 규제, 경제민주화 등 각종 규제, 각종 이익집단의 이익 유지 강화 위한 규제 등 규제 종류를 나열하면서 "규제혁파에는 너무도 많은 저항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개원 초기 국민공감대를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화순 교수는 "20 대 총선의 여야정책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총체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고 정책들이 조화롭지 못하며, 정치적 타협이 없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파적 이해와 정치공학이 정치적 갈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제 3 의 전문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의 문제는 '대립 쟁점'이기 보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존재하는 '합의 쟁점'이 되게 하고, 정부중심에서 사회구성원들 간 자발적인 행위에 의한 균형적인 사회통합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옥남 실장은 "20 대 국회는 우선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보다 질적인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제도를 도입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괴리가 있는 현재의 국회를 세비 책정의 법적 근거 및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이 공감하는 국회윤리위원회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대영 교수는 "한류 문명을 발화시키기 위해 문화 중산층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군소도시까지 전파될 수 있는 문화신경망 시스템인 '풀뿌리 문화신경망'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문화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되짚어보아야 하며 20 대 국회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글로벌 문화경쟁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에 한류문명의 발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다듬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문화강국으로 나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예술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오래도록 유지 전승되어 온 “지식, 신앙, 도덕, 법률, 관습 등 개인이 사유를 통해 습득한 습관이나 습속의 총체”를 일컫는 말로 우리 삶의 기반이자 뿌리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잘사는 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 고유의 것은 제쳐두고 서양 문명이 우리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가늠하지 않고 무조건 들여와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을 포함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은 문화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문화 경쟁 시대에 문화선진국으로 앞장서려면 하루빨리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화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태양의 후예를 비롯한 드라마, 영화, k-pop, k-beauty 등 한류문화를 넘어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반이 되는 문화를 재창조하고 우리의 정신문화를 확대하여 ‘한류문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문화 교류 활성화로 문화 뿌리를 다지자!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문화가 어느 곳에 서 있고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명확한 자기 발견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점은 해결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목적을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문화 경쟁 시대에 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통합을 위한 우리의 문화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 회복과 융성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유문화를 재정립해 우리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행사와 관광테마를 만들어 문화마을을 형성해 이를 중심으로 문화 프로그램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고유문화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정체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나아가 각 지역 상호간의 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문화신경망'을 구축한다면 우리의 문화뿌리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교류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우리 고유 문화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소통과 통합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새로운 우리 문화가 창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⑥ 손재정(고려대학교 중국학부)



오는 6 월 20 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의 전문가들이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짚고, 20 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8 일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봉서, 회장 이배용)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 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하로 10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무능하고 실적 없는 국회로 낙인찍힌 19 대 국회가 5 월 말 임기를 종료하고 20 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정치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피력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병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에 오정근 건국대 금융 IT 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대영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나섰습니다.



신성장산업, 한국의 새싹입니다

오정근 교수는 "20 대 국회는 중장기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구조개혁, 규제혁파,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 교수는 혁파해야 할 규제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규제혁파에는 너무도 많은 저항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개원 초기 국민공감대를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조화순 교수는 20 대 총선 당시 여야의 정책공약들을 분석하고 "총체적 시각과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돼 있고, 정책들이 조화롭지 못하며, 정치적 타협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싸우지 맙시다

조 교수는 "사회정책은 정치적 갈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 3 의 전문적 논의기구를 통해 직접적인 정치 갈등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조 교수는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의 문제는 '대립쟁점'이기 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합의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옥남 정치실장은 "20 대 국회는 우선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중 상시국회 운영제도 도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괴리가 있는 현 국회의 세비 책정 법적 근거 및 운용 투명성 확보 △국회의원 특권 제한 △국회윤리위원회 활동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화 중산층은 대리의 발점대와 같습니다

이대영 교수는 "20 대 국회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글로벌 문화경쟁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에 한류문명의 발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다듬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한류문명을 발화시키기 위해 문화 중산층을 강화"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교수는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군소도시까지 전파될 수 있는 문화신경망 시스템인 '풀뿌리 문화신경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려워지고, 민생은 허덕이는 가운데 정쟁을 일삼던 19 대 국회의 혼미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20 대 국회는 국민들이 던져준 메시지 '협치'를 받들어 한국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구하기 위해 절치부심해야 할 것입니다.



협치. 대한민국에 나에게해 할 같습니다

각 국회의원들은 분발하여 각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그러한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거시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 경제 입법에 도움을 주고 국회의 전문성 강화에 조력할 수 있는 경제 고문단을 신설하여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용기를 잃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두 이를 위하여 자신의 본분을 다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⑦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 월, 20 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의 전문가들이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짚고, 20 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논의하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28 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 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10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정근 교수는, 20 대 국회는 중장기 성장정책과 함께,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구조개혁, 규제혁파,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 혁파에는 많은 저항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개원 초기에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화순 교수는 20 대 총선 당시 여야의 정책공약들을 분석하고 총체적 시각과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되어 있고, 정책들이 조화롭지 못하며 정치적 타협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20 대 국회에서는 사회정책이, 정치적 갈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입법역량의 출범을 앞두고

이를 위해 제 3 의 전문적 논의기구를 통해 직접적인 정치 갈등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교육과 복지, 일자리 등의 문제를 '대립 쟁점'이 아닌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합의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옥남 정치실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중 상시 국회 운영제도의 도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괴리가 있는 현 국회의 세비 책정 법적 근거 및 운용 투명성 확보, 국회의원 특권 제한, 국회윤리위원회 활동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영 교수는 20 대 국회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글로벌 문화경쟁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에 한류문명의 발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다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류문명의 발화를 위해 문화 중산층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군소도시까지 전파될 수 있는 문화신경망 시스템인 '풀뿌리 문화신경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정근 교수는 여소야대 20 대국회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내년 대선전 금년은 한국경제 희생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처(Thatcher)와 같은 고통분담 대국민 호소력과 강력한 리더십, 슈뢰더 (Schroder) 같은 정권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국가경제와 미래세대 국민만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가다운 비전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분배의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일 것 같았던 단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5%라는 사상최고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규제혁파가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 재벌, 노동의 3 대 개혁이 절실합니다.



구조조정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개혁과 규제혁파에는 너무도 많은 저항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4.13 총선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짐으로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20 대국회 개원초기 일사분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회에 입법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첫째로 KBS, SBS, MBC 방송 3 사에서부터 관련 광고를 방영해야 합니다.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방송사들이 관련 광고를 방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 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방송3사 부터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내년 대선정국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가 구조개혁 타이밍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때에 구조개혁을 단행 할 수 있게 전국민들이 구조개혁&규제혁파 입법요구 1000 만 서명 운동을 벌려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생사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20 대국회가 경제를 살리는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 생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구조조정과 규제혁파를 일사분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⑧ 이승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20대 국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6 월부터 출범하게 될 20 대 국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네 가지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재)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102 차 월례토론회에서 '20 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제부문에 대해 오정근 교수는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내년 대선을 치르기 전 올해가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중장기 성장정책과 단기 안정화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구조개혁, 그리고 규제혁파에 힘써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이용해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한 방안

다음으로 조화순 교수는 사회부문에 대해 세대갈등, 계층갈등, 그리고 노동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경제 격차가 다중격차를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총체적 시각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정치부문에 대해 이옥남 정치실장은 입법부가 법을 무시하는 관행을 문제점으로 짚으며, 국회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부가 정상화되어야 그 다음 단계인 국회 및

정치발전을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화부문을 맡은 이대영 교수는 지금 우리 문화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되짚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국회가 문화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바라는 사항에 귀 기울여야 한다

위 네 분의 전문가들이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20 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은 국희의원이 자신들의 특권이나 특혜를 내려놓고 국민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20 대 국회에서 가장 '입성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가장 인기가 떨어지는 곳은 국방위였습니다. 굵직한 대형공사로 지역구 치적을 쌓고 싶어 하는 의원들에게 국토위가 매력적인 상임위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4 차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 제재가 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국내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국회의원들이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시급한 민생처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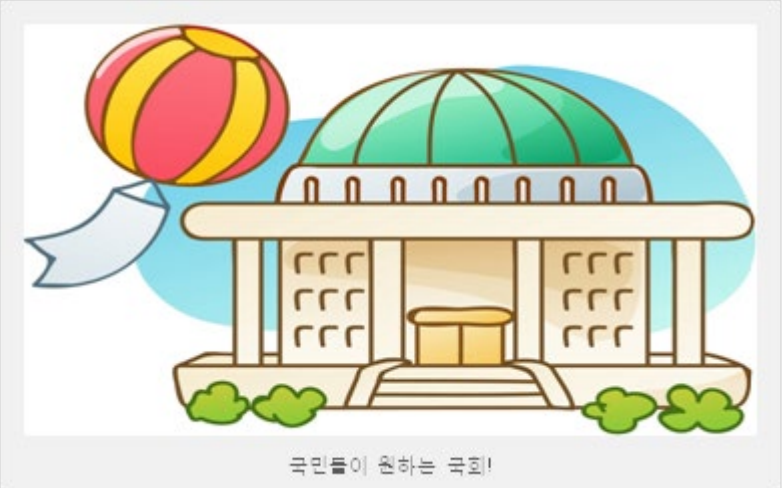
자녀의 취업 청탁과 같은 문제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녀 취업 청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열정 페이 강요 등의 문제들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19 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1: 베이비뉴스
2: 국민권익위원회
3: 프레시안
4: 국민일보

⑨ 이재환(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6 월부터 출범하게 될 20 대 국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네 가지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재)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102 차 월례토론회에서 '20 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제부문에 대해 오정근 교수는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내년 대선을 치르기 전 올해가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중장기 성장 정책과 단기 안정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구조개혁, 그리고 규제혁파에 힘써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이용해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화순 교수는 20 대 총선 당시 여야의 정책공약들을 분석하고 "총체적 시각과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돼 있고, 정책들이 조화롭지 못하며, 정치적 타협도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정책은 정치적 갈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제 3 의 전문적 논의기구를 통해 직접적인 정치 갈등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의 문제는 '대립쟁점''대립 쟁점'이기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합의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옥남 정치 실장은 "20 대 국회는 우선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중 상시국회 운영제도 도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괴리가 있는 현 국회의 세비 책정 법적 근거 및 운용 투명성 확보, 국회의원 특권 제한, 국회 윤리 위원회 활동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대영 교수는 "한류 문명을 발화시키기 위해 문화 중산층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군소도시까지 전파될 수 있는 문화신경망 시스템인 '풀뿌리 문화신경망'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문화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되짚어보아야 하며 20 대 국회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글로벌 문화경쟁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에 한류문명의 발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다듬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입니다. 필연적인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무한경쟁으로 경제는 성장했지만 경제외 문화같은 분야에서는 아직 빈약한 편입니다. 여러가지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화선진국들을 모방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나라에는 없는 '대한민국'만의 문화를 독자적으로 발견해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수도권 중심으로만 정체되어 있는 문화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들을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탄광촌이였던 강원도는 탄광산업이 죽고나서 낙후되었지만 강원랜드사업등 여러가지 관광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한듯 다른 지역들을 문화적 도시로 자리잡게 하는것이 이번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⑩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내용으로 102차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오는 6 월 20 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의 전문가들이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짚고, 20 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월 28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20 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하로 10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19 대 국회가 5 월 말 임기를 종료하고 20 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정치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피력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정근 교수는 "20 대 국회는 중장기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구조개혁, 규제혁파,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혁파해야 할 규제의 종류을 나열하면서, "규제혁파에는 너무도 많은 저항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개원 초기 국민공감대를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16총선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조화순 교수는 20 대 총선 당시 여야의 정책공약들을 분석하고 "총체적 시각과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돼 있고, 정책들이 조화롭지 못하며, 정치적 타협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정책은 정치적 갈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 3 의 전문적 논의기구를 통해 직접적인 정치 갈등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의 문제는 '대립쟁점'이기 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합의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옥남 정치실장은 "20 대 국회는 우선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 연중 상시국회 운영제도 도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3) 현 국회의 세비 책정 법적 근거 및 운용 투명성 확보 (4) 국회의원 특권 제한 (5) 국회윤리위원회 활동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화 다양성을 갖기 위해 풀뿌리 문화 신경망을 갖추어야 한다

이대영 교수는 "20 대 국회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글로벌 문화경쟁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에 한류문명의 발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다듬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한류문명을 발화시키기 위해 문화 중산층을 강화하고,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풀뿌리 문화신경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란 공동체가 그 시점까지 필요에 의해 유지 전승한 생활습관의 총체를 말합니다. 문화에는 사회의 도덕, 법률, 관습, 가치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분위기는 문화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는 국가의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고 왜곡되어 있다면, 한 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곧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국가의 대사(大事)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화 정책에 관련된 공약은 정치권에서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과 사회복지와 같은 정책과는 달리 문화 정책은 시급성이 딱히 체감되지 않고,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수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그 어느 것보다도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 짓기도 합니다. 헬조선을 부르짖는 요즘, 우리는 경제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는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지향하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가나 국민이나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외국의 것이라면 모방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지만, 한민족의 전통 문화는 사라지고 국민들은 근본 없고 획일화된 문화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진통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경제수준은 여타 선진국만큼 높지만 우리는 높은 자살률, 낮은 출산율, 증가하는 미혼율 등으로 알 수 있듯이 국민은 불행에 처해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신적인 여유를 보이지 않고 불투명한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불행의 원인은 저성장 국면으로 변모한 이유도 있지만, 문화가 고속성장으로 인해 문화가 잘못 쌓아올려져 온 탓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타 다른 시급한 경제정책처럼, 대한민국 사회가 더 틀어지기 전에 문화정책의 재정비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우선 사회의 목표가 물질적인 부의 축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목표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취미나 문화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룩해내기 위해서는 국가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야합니다. 단순히 문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문화시설을 건설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문화시설이 있어도, 정작 시간이 부족하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종류의 문화 생활도 즐길 수 가 없고, 국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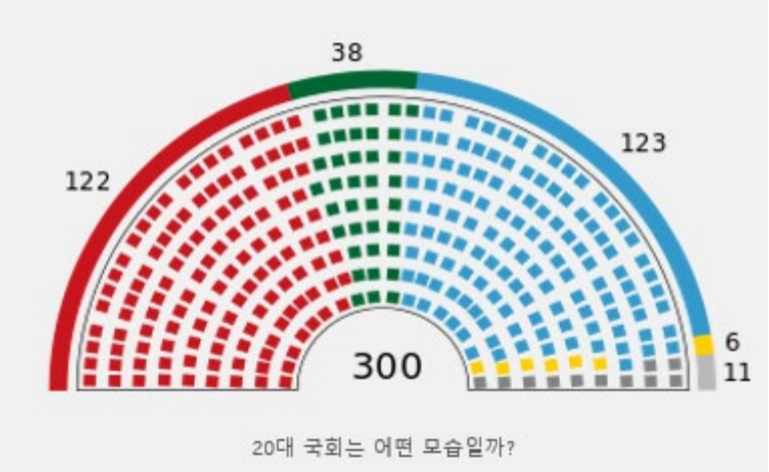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이유는 공무원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업체에게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이를 보다 더 엄격하게 단속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피폐한 삶이 아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보장이 된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문화는 건전하게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⑪ 정승훈(단국대학교 철학과)



오는 6 월 20 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의 전문가분들이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짚고, 20 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무능하고 실적 없는 국회로 낙인찍힌 19 대 국회가 5 월 말 임기를 종료하고 20 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정치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피력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정근 교수는 20 대 국회는 중장기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구조개혁, 규제혁파,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 교수는 혁파해야 할 규제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규제혁파에는 너무도 많은 저항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개원 초기 국민공감대를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대 국회, 규제개혁 절실하다

이어 발제에 나선 조화순 교수는 20 대 총선 당시 여야의 정책공약들을 분석하고 "총체적 시각과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돼 있고, 정책들이 조화롭지 못하며, 정치적 타협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교수는 "사회정책은 정치적 갈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 3 의 전문적 논의기구를 통해 직접적인 정치 갈등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의 문제는 '대립쟁점'이기 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합의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옥남 정치실장은 "20 대 국회는 우선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서 1.연중 상시국회 운영제도 도입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3.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괴리가 있는 현 국회의 세비 책정 법적 근거 및 운용 투명성 확보 4.국회의원 특권 제한 5.국회윤리위원회 활동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대영 교수는 "20 대 국회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글로벌 문화경쟁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에 한류문명의 발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다듬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한류문명을 발화시키기 위해 문화 중산층을 강화하고,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군소도시까지 전파될 수 있는 문화신경망 시스템인 '풀뿌리 문화신경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 중산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현행 한국은 1%의 천재가 모든 창의적 생산물의 36%를 담당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화 중산층을 두텁게 하여 문화발전을 민주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가장 필요한 정책제안방향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TV(브라운관) 개혁입니다. TV 의 발명 이후 세계인들의 일상 속에는 늘 TV 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미우나 좋으나 현대인들은 TV 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고 이것은 TV 의 문화적 가치를 올리면 국민의 의식수준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TV개혁이 절실하다.

따라서 아침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일명 '막장드라마'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교육방송인 EBS 나 오래된 형식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있는 몇몇 방송사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 우리 나라 국민들이 TV 가 더 이상 바보상자가 아닌 지식과 정보의 전달매체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생산성을 더욱 높여주는 방송이 되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사람들은 창조적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시대의 일원으로서 지식과 정보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샐러던트, 평생학습과 같은 단어가 보편화된지도 벌써 오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기계발 욕구를 TV 에서 문화적, 지적, 학술적으로 채워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⑫ 조형원(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20 대 국회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가 4 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선진화포럼은 20 대 국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경제, 사회, 정치, 문화로 세분화한 102 차 월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제부문 발제를 맡은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한국이 중장기 구조적 저성장기에 진입했으며 분배구조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분배 포퓰리즘 증가의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업률도 사상 최악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2016 년 기준으로 12.5%에 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오정근 교수는 20 대 국회에서의 중장기 성장정책과 단기 안정화정책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장기 성장정책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구조개혁, 규제혁파,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단기 안정화정책으로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고 신뢰를 올려놓길 소망합니다

정치부문 발제를 맡은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20 대 국회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하고, 국회법 준수를 통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 대 국회가 연중 상시국회 운영제도를 마련하고 예산 심의와 결산, 국정감사기능, 외교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비제도 개선과 특권 포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를 정상화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입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화부문 발제를 맡은 이대영 중앙대 교수는 오늘날 세계가 배타적 냉전 시대에서 공유와 소통의 시대로 변하면서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면서 20 대 국회는 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고 한류문명을 기초하고 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중산층을 강화하고 풀뿌리 문화신경망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통일시대를 대비해 문화교육시스템을 주창하고, 문화법령 및 제도를 확보하고, 문화법령체계의 조정 및 행정난맥을 개선하고, 문화 빅데이터 시스템을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부문 발제를 맡은 조화순 연세대 교수는 한국 사회가 네트워크 사회로 변하면서 세대갈등, 계층갈등, 노동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겪게 되었고 특히 세대-인종-지역-계층을 망라하는 다중격차가 심각하게 증가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20 대 국회의 3 대 정당이 내세운 정책들은 총체적 시각, 조화된 정책, 조화된 정치적 타협, 국민공감대가 결여되어 있다면서 앞으로는 정책 경쟁의 원칙, 공감대 형성의 원칙, 균형 잡힌 사회통합 원칙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2015 년 출산률은 1.25 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65 세 이상 인구의 고령화률은 2030 년에 24.3%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장차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국가적으로 이중의 인구재앙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출산률을 높이지 못하면 미래 한국은 죽어가는 사회가 되거나 이주민들에게 지배당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출산률의 반전을 20 대 국회가 해내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계획을 세운 후 출산 장려를 위한 법안을 의결하고 예산을 끝임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은 효과가 없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20 대 국회가 크게 변해야 합니다. 출산장려위원회를 만들고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 의원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해서 여성과 가족의 입장에서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안정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출산 장려금이 부족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도 경쟁에서 살아남을만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안 낳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휴가와 퇴근이 어렵고, 교육비는 너무나 높고, 청년실업률도 높으니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20 대 국회는 복지 제도 확충이 출산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 멸망을 막기 위한 대전략 차원에서 복지 제도를 다루어야 합니다. 인구정책 만큼은 여야가 합심해서 정쟁에 휘둘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20 대 국회가 활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내년이 되면 대선 때문에 국회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인구정책에 대한 대전략을 세워서, 가라앉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1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10000307
사진 3 출처:
http://ahaeconomy.flash21.com/News.aha?method=newsView&n_id=7659&cid=120&pid=87
사진 5 출처: http://media.daum.net/m/election/2016/0413/vote/result?type=all 다음뉴스 SBS

⑬ 주아람(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다가오는 20대 국회

다가오는 6 월, 20 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의 전문가들이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짚고, 20 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논의하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28 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 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10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정근 교수는, 20 대 국회는 중장기 성장정책과 함께,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구조개혁, 규제혁파,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 혁파에는 많은 저항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개원 초기에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화순 교수는 20 대 총선 당시 여야의 정책공약들을 분석하고 총체적 시각과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되어 있고, 정책들이 조화롭지 못하며 정치적 타협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20 대 국회에서는 사회정책이, 정치적 갈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 3 의 전문적 논의기구를 통해 직접적인 정치 갈등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교육과 복지, 일자리 등의 문제를 '대립 쟁점'이 아닌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합의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합의 쟁점을 대상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이옥남 정치실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중 상시 국회 운영제도의 도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괴리가 있는 현 국회의 세비 책정 법적 근거 및 운용 투명성 확보, 국회의원 특권 제한, 국회윤리위원회 활동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영 교수는 20 대 국회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글로벌 문화경쟁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에 한류문명의 발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다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류문명의 발화를 위해 문화 중산층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군소도시까지 전파될 수 있는 문화신경망 시스템인 '풀뿌리 문화신경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선거들에선 문화 부문에 대한 공약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문화가 생활이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문화와 정신문명의 발전 없이 한국이 진정한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촌락에서부터 시작되는 풀뿌리문화운동

지금까지는 20 세기의 방식으로 21 세기의 문화 코드를 해석하려고 하면서 곳곳에서 신구갈등이 벌어지고 남녀간,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문화적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 공유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인 문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주요 문화시설들이 대부분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몰려있어 지방 소도시나 촌락에서는 이러한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은 설비비용이 막대하므로 대부분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나 수도권에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규모 촌락이나 지방에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문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풀뿌리문화신경망'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산물이나 향토 유적지, 특색 있는 자연 경관을 테마로 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박람회를 통해 문화 접근성을 향상시키자.

획일화된 대도시의 문화 시설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문화생활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향유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남녀노소 모두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문화를 느끼며 친근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양식을 가까운 촌락들 간에, 더 나아가서는 주요 도시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 단위의 대규모 문화행사를 여러 촌락과 도시들이 함께 개최하여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별 개성을 살린 문화 아이템을 고안하여 문화 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면서 많은 문화 시설 이용객들을 확보하고, 문화 산업이 활성화되면 이용객들의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지역별로 문화를 육성하고, 또한 이것을 타 지역 문화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소통하면서 '풀뿌리문화신경망'이 구축이 된다면, 지역 간 문화 격차와 갈등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⑭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19대 국회의 막이 내리고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19 대 국회의 임기가 사실상 끝이 났다. 이제 20 대 국회의 발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회는 이번 총선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난 국회가 했던 실수를 또 다시 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며 의정활동보다 다른 이슈를 정쟁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는 불신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한 마디로 불신과 갈등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자신의 억눌린 분노를 풀어버리는 만행이 드러나는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정신적인 성숙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 유전자가 필요하다. 토인비에 따르면 인류문명을 크게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으로 나눈다면 문화는 정신문명이다. 우리나라는 물질문명은 어느 국가 못지않게 성장했지만 급속한 성장으로 정신문명은 이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다.

문화 유전자는 무엇인가? 바로 조화, 균형, 평등, 나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고조선 시대의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도여치 등 선조들의 사상에서부터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 내재되어있었다. 이러한 문화 유전자는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으나 현재 사라지고 있는 형국에 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에서 이를 눈치 챌 수 있다. 서로를 혐오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들어내고 있으며, 세대와 계층 간에 갈등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이 안에 조화와 나눔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은 출산과 결혼을 포기하고 있고 물질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문화 정책을 강화하여 우리의 조화, 나눔, 균형의 정신을 일깨워야 한다.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잠들은 문화 유전자를 다시 깨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국회는 한류 문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체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생활문화공동체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시민클럽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전통 풍속과 인문예술, 그리고 스포츠의 향유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삶의 질이 높은 진짜 중산층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을 통칭한다. 소득을 가지고 중산층을 정의하는 우리와 달리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한다. 영국에서는 페어플레이 정신, 신념 소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프랑스에서는 1 개 이상의 외국어 능력과 스포츠 활동, 악기 연주능력, 봉사활동 등으로 정의한다. 우리도 이러한 점을 본받아 훨씬 더 나은 중산층이 나올 수 있게 문화적 여건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문화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 통계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에 우리 문화정책은 문화시설 같은 하드웨어 증설 및 개선에만 중점을 두어 왔다. 한류 문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트렌트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 문화정보들을 체계적이고 통합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문화에서 소외되는 지방을 보살피며 도시와의 문화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소외를 당하고 있는 도시 외 지방의 문화 활성화와 풀뿌리 문화신경망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획일화되어 가는 도시 중심의 문화를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분출을 통해 우리 문화의 격을 한 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 대부분의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에 문화시설에 몰려 있는데 이에 대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누리기 어렵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도시와의 문화적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군소도시 소읍까지 전파될 수 있는 풀뿌리 문화신경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전통적이면서도 독특한 고유문화가 도시에 진출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경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산해 내지 못하듯이 문화가 없는 사색은 결코 좋은 과실을 생산해 낼 수 없다.' 이 말은 미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언 중 하나이다.

문화야말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경제 문제와 행복, 사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 20 대 국회가 우리나라를 전보다 더 나은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며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그들이 수고할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권순형(서울대 경제 3) : 안녕하십니까?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20 대 국회에 바란다 : 문화강국 대한민국'입니다. 오는 6 월, 새로이 구성되는 20 대 국회에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인류문명을 크게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질문명은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정신문명은 빈곤합니다.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강조하며 물질문명에 지나치게 매몰된 까닭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공동체는 붕괴했고, 사회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모두가 무한경쟁에 매몰되어 서로의 '콩 한 쪽도 빼앗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가 발표한 〈Better Life Index 2015〉에서 우리나라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이나 친구 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인 공동체 영역에서 36 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토록 공허한 우리의 정신문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준 높은 문화를 창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만 년 넘게 쌓아온 우리 민족의 개성을 발휘하여 72 억 지구촌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한다면, 오늘날 다품종소량시대에 걸맞은 상품을 만들어내어 물질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 풍성한 문화로 누려요

여태껏 우리나라는 산업입국(産業立國)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문화입국(文化立國)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 대 국회가 우리나라를 문화입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성원(서울대 심리 3) : 저는 문화를 융성하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를 향유할 줄 아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돈 버는 것만을 최고로 아는 분위기입니다.

듣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1 억 원 이상의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주말에도 근무지에 나와 주 60 시간씩 근무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가족과 여가는 뒷전으로 두고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는 20 대 국회에서는 돈은 좀 덜 벌더라도 문화생활을 적절히 향유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순형(서울대 경제 3) : 프랑스에서는 백 년이 넘도록 일요일 영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말만큼은 가족들과 지내고 문화생활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문화생활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요? 많은 이들에게 중산층은 행복한 삶에 대한 하나의 사회적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중산층을 많은 소득, 풍요로운 소비 등 경제적인 의미에서만 정의했습니다. 이제 '중산층'의 개념에 문화사회적 기준을 추가하여,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장면. 문화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고양시킵니다.

나세정(서울대 경제 3) : '문화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문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문화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거나, 가족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정해서 그 날에는 온가족이 더 저렴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는 속담처럼, 문화생활도 즐겨본 사람만이 즐길 줄 압니다. 20 대 국회는 문화생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김원빈(서울대 경영 4) : 높은 문화의 힘은 정신문명뿐만 아니라 물질문명도 동시에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예의범절을 중시하고 장인정신이 발달해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문화의 특색은 식문화에도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님을 깍듯이 대접하고, 손님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한 평생을 바치는 요리 장인들이 있는 것이죠. 덕분에 일식은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고급 요리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한식은 아직 세계인들에게 낯설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식도 잘 발전시키면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고급 요리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나물을 사용하고 가공을 적게 하여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한식은 세계적인 건강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과 인테리어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살린다면, 한식은 도시에서의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건강함과 자연의 경험을 제공하여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의 결과, 이렇게 맛있는 한정식 뷔페가 탄생했네요

배근표(서울대 경제 3) : 그런데 문화의 발전은 어떻게 유도해야 할까요? 저는 '경쟁'을 통해 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애슐리, 빕스 등 서양식 패밀리 레스토랑의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그러자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별곡, 계절밥상과 같은 한정식 뷔페를 개발했습니다. 한식의 품격을 끌어올린 이 한정식 뷔페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자연별곡은 작년 11 월에 상하이 지역에 중국 1 호점을 오픈하였는데, 개점 100 일 만에 약 20 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일 평균방문객 수가 1 천 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우리 한식의 품격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한식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한옥호텔의 조감도. 기업을 앞장세워 전통문화를 부활시킵시다!

송수혁(서울대 경제 4) : 저는 이러한 경쟁의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 월, 호텔신라가 최초로 한옥호텔 건립을 허가받았습니다. 한옥호텔은 주변의 한양도성 및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고유의 전통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정식 뷔페의 사례나 한옥호텔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전통문화 연구 및 사업을 장려해야 합니다. 전통문화 연구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전통문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혁파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진현(서울대 경제 3) : 또한,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285 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 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주말 근무는 최소화하는 근로문화의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20 대 국회는 초과근무가 많은 정부부처와 공기업에 대해서는 업무평가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정부가 노동시간 감축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의 조직문화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최근 현대카드는 불필요한 보고 관행을 없애고 PPT 활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직원들의 생산성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례를 잘 홍보하여 다른 기업에서의 조직문화 혁신을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형(서울대 경제 3) : 여러분의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기준과 함께 문화사회적인 기준으로도 평가하는 '문화 중산층'의 개념을 도입하고, 문화생활을 사람들이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통문화의 부활은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최근 한정식 뷔페의 성공과 한옥호텔 건립 허가는 기업들의 경쟁의 산물입니다. 20 대 국회는 전통문화의 연구 및 사업에 대해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와 같은 지원책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가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초과근무가 많은 부서와 공기업에는 업무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기업에서의 성공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정신은 풍요로워짐으로써 행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풀뿌리가 모여 밝은 세상이 됩니다

손재정(고려대 중국학부 3 학년) : 대학생들의 토론주제는 '정치에 있어 풀뿌리 신경망을 조직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정치권에 잘 반영되도록 하려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생각하는 것을 각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우(고려대 중국학부 2 학년) :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청년들이 좀 더 현실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정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혁(고려대 공공행정학부 1 학년) : 정치란 뭔가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을 봐도 알기 힘든 말들을 하기 때문에, 정치가 쉬운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을 버리고 쉬운 것으로 구성된 정치라는 인식이 퍼지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블럭과 같이 쉽게 쌓아올려야 합니다

이민영(고려대학교 전자공학부 2 학년) : 정치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보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먼저 노력하지 않으면 남들이 돌아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먼저 다가서도록 해야 합니다.

우영우(고려대학교 경제학부 1 학년) : 국회의원들의 특권 포기 선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이러한 행동보다는 특권을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특권을 부여한 것에 의미가 있었을 것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듯 합니다.

손재정(고려대학교 중국학부 3 학년) : 국민적 공감대가 국회에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국민들과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지역구민에게 즉시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식단이 먹기에 좋듯, 다양한 구성원의 정치참여가 보기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의정평가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은 각 직능별 적정 인원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영입되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국회의원에게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승현(고려대 경제 3):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20 대 국회 출범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각자 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국회에 바라고 있는 다양한 사항들 중에, 오늘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과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정(고려대 경영 3): 저는 무엇보다 이번 초선 당선자들이 특권을 배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당선자로서의 초심을 잘 간직하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한 층을 올라가는 데 승강기를 이용하는 초선 당선자들

초선 의원 의정 연찬회에는 여러 명의 지각자와 불참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한 당선자들이 '의원 전용 출입문'을 통해 의원회관에 들어가고, 한 층을 올라가기 위해 승강기를 이용하는 모습은 특권부터 배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심진수(고려대 미디어 3): 공감합니다. 초선 의원들이 이런 과잉 의전에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실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여야는 큰 선거를 앞두거나 국민의 눈총을 받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했지만 실천에 옮긴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몇몇 초선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 받는 첫 월급의 절반을 기부하고, 세비삭감, 국회의원 의석수 줄이기 등의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들을 실제로 지킬지는 의문인데, 국회의원 세비 삭감은 선거 때마다 단골공약이지만 지켜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번에는 정치권의 세비 삭감과 반납 공약이 이행되는지 국민들이 눈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난 19 대 국회처럼 정쟁을 일삼다가 또다시 '식물국회'가 되지 않기 위해 실적평가와 감시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연(고려대 영어영문 2): 이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의회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이미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농부, 간호사 등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임기가 끝나면 70%정도는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개인 보좌관이나 비서관 없이 주당 80 시간 일 년 내내 일하지만 세비는 우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먼저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 일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국회 개혁에 힘써야 한다

전지원(고려대 경제 3): 저는 20 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국회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개혁을 국회 스스로에게 맡기기 어렵다면 여러 시민단체에서 범국민운동을 벌이고, 언론에서도 국회 개혁 필요성의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진정한 국회 개혁 없이는 국가 발전과 경제 안정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선거가 끝나면 여러 특혜를 누리고,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기보다 사리를 채우려 하는 의원들의 행태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 개혁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이승현(고려대 경제 3): 20 대 국회의 첫 출발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특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정치개혁도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1: 연합뉴스
2: 중앙일보
3: 한겨레
4: http://cafe.naver.com/playtomato/461005



20대 국회에게 바라는 안건을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토의하였다.

이주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3 차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연구모임에 참가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20 대 총선을 통해 제 20 대 국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전 총선과는 달리 20 대 투표율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 19 대 총선과 비교해서 20 대 투표율은 약 13% 오른 49.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자조적으로 비하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다는 것이 큰 이유라고 청년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보았습니다.

저는 1960 년대 이후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속 성장을 그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속 성장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배불리 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화가 잘못 쌓여졌습니다.



고속성장 속에 잘못 쌓아져 올려진 한국 문화

그렇다면 잘못 쌓여진 우리 문화가 정신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돈을 인생의 목표자체로 삼는 문화나 비교문화 등이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년 문화를 건강하게 할 방안을 여러분들과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과 20 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의 시각에서 20 대 국회에게 바라는 문화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권원중(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저도 방금 이야기 한 것에 동감하고, 문화의 중요성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주제입니다.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헬조선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저 또한 입대 전과 비교하여 대학 내 분위기가 팍팍해진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으로 헬조선을 부르짖고 있다.

정석환(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현재 취업이 힘든 것은 사실이고 저 또한 힘든 취업을 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힘들 긴하지만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인 것처럼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뿐만 아니라 세계가 글로벌리제이션 현상에 들어서면서 비숙련 노동수요가 줄었고 따라서 이러한 취업난은 한국만의 유일한 현상이 아닙니다. 명망 있는 다른 선진국들도 또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이에 따른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하면 저 또한 이주명 학우가 앞서 말한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돈은 목적이 아닌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 문화가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화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제가 말하는 것은 체육관 같은 시설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가 생활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차준용(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동의합니다. 체육관 같은 시설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지방 쪽은 부족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미 체육관 등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은 공공시설로든 민간시설로든 많이 공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최근 20-30 대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기준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젊은 층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는 수요를 보여주며, 이는 곧 많은 일자리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함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저는 20 대 국회가 직장인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야근 같은 것을 무급으로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저 또한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된 직장을 원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준용 학우의 의견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강하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한국에서 반기업적이라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기업적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더불어 살기 위한 규제라고 인식하는 의식의 변화 또한 요구될 것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준수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주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의 강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 야근을 시키면서 수당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 야근을 시키면서도 수당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잦은 야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파견근로 허용, 대체인력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통한 JOB SHARING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의 법안이 시행된다면 JOB SHARING 을 통해 과다하게 부과되는 야근을 없앨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 대 국회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문제 원인에 대한 토론과 20 대 국회에게 바라는 문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러한 토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의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은 다른 학우와도 토론하여 울림이 되어 널리 퍼지도록 합시다. 20 대 국회가 좋은 문화 정책을 내길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한슬(정외 3): 안녕하십니까?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 월 20 일 20 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외국의 사례 등과 비교해보았을 때 과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와 법을 통해 이를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당선인들 스스로가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고 윤리위원회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오늘은 국회특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지수(사학 2): 20 대 총선 전 한 프로그램에서 출석이나 발의법안 수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워스트 국회의원 세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1 위한 사람이 20 대 총선에서 또 한 번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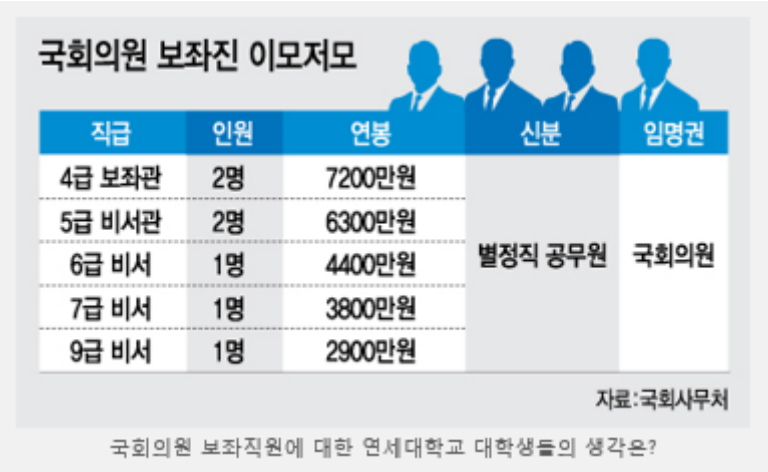
그 사람은 1/3 만 출석하고 발의법안도 5 개 이하였는데 20 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8 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투표는 인기, 유명세, 이름값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 스스로 먼저 그런 것을 알고 투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국회의원마다 활동, 출석 정도를 공개해야 합니다.

김한슬(정외 3): 국회의원 선거를 나갈 때 전년도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성실히 활동했는지 반드시 올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률 등의 정보가 접근 가능하도록 중앙선관위 사이트 공약집에 같이 올린다든가 선거 홍보물에 함께 써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주현(정외 2): 혹은 그 역할을 시민단체가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20 대 총선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3 분 총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 이름을 검색하면 정책과 과거 발언, 범죄경력, 학력 등이 나오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시민단체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재환(경제 2): 팟캐스트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매 선거마다 전국에 있는 후보들을 다 조사해서 얘기해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모든 후보자들을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들도 홍보만 잘 된다면 유권자들이 정보를 얻는 데에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한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의 생각은?

김지수(사학 2): 저는 국회 보좌직원이 7 명이나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7 명 중에서도 2-3 명으로 그룹이 나뉘는데 상위 그룹은 별정직 공무원 4 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스웨덴의 경우처럼 보좌직원을 없애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를 줄이고, 보좌직원을 뽑는 과정을 현행 국회의원의 단독 결정에서 조금 더 공정한 절차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현(정외 2): 저는 국회의원에게 보좌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박사나 전문가 등 실제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최근 법률을 통해 4 촌 이내에는 보좌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해두었습니다. 저는 보좌직원을 누구로 뽑든 그 의원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 친인척이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라서 뽑은 것이 아니라, 보좌직원으로 뽑힌 친인척이 한번도 출석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다윤(정외 2): 보좌직원으로 뽑히면 4 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보좌직원 채용을 국회의원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제한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좌직원의 수를 줄이고 채용에 있어서 제한을 두어야 좀 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재환(경제 2):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시험 전 날 미시경제학 책을 다 읽어야 하는 그런 느낌의 업무량에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엄두를 못내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김한슬(정외 3): 저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스웨덴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스웨덴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월급도 적고 보좌직원도 없고 교통비 등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 명이 약 17 만 명을 대표하니까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및 급여에 대한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의 생각은?

김지수(사학 2):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교통비, 급식비 등 연봉 외에 국회의원에게 부가적으로 주는 비용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한해 연봉이 1 억 3 천 정도 되는데 그것 외에도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하루에 약 3 만 원씩 특별활동비가 더해진다는데 왜 굳이 이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명절 휴가비도 받는데 그것이 GDP 대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필요없는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 모두 합해 1 년 동안 84 억입니다. 명확한 이유없이 지나친 복지가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주현(정외 2): 저는 국회의원이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회사원의 경우에도 연봉이 1 억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관이나 차관급은 국회의원들보다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왜 국회의원에게만 특권, 특혜 논란이 있을까요?

행정부나 다른 부처의 연봉도 같은 비교선상에 놓고 얘기해야 하는데 왜 국회의원만 많은 특권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분명히 국회의원 일부가 자신의 권한을 특권인 냥 행사하겠지만 그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속의 사람들의 문제이고,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이 투표 등의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한슬(정외 3): 동의합니다. 시민의 노력뿐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도만을 바꿔서는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혜논란을 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 대한 높은 불신은 국회의원의 특권 논란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다윤(정외 2): 소수의 불성실한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질 확률이 높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을 불신하게 합니다. 반면에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논란이나 이슈가되는 것이 드뭅니다.

국회특권문제는 국회에 대한 높은 불신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특권이 실제로 지나친 측면과 더불어, 몇몇 국회의원의 눈에 띄는 실망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특권이 더욱 과장되어 보이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방주현(정외 2): 네, 그리고 요즘은 국회 내부에서도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 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20 대 국회에서도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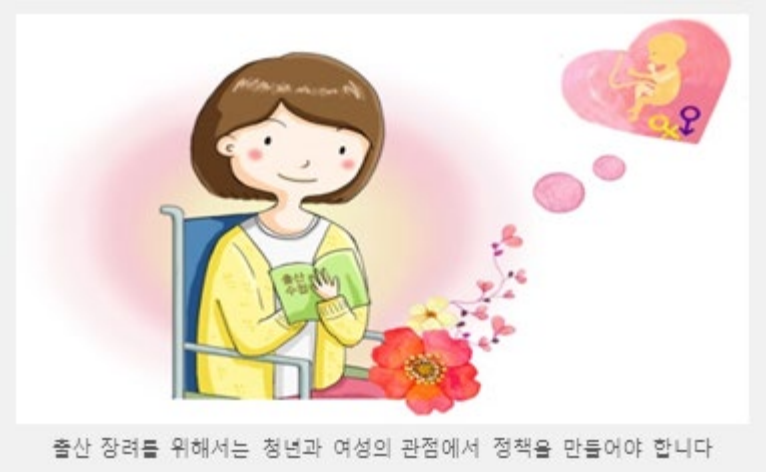
국회'특권'이 아니라 그것을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지원'이나 '권리'라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 딴짓하는 모습 등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존재하고 이것이 결국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 같습니다.

김한슬(정외 3): 여러분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전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보좌직원의 수나 보조직원 채용과정의 공정성 문제, 국회의원의 수에 관한 문제, 연봉 등 급여에 관한 문제등이 논의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국회특권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몇몇 특권의식을 가진 국회의원의 언행이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 국회의원이 누리는 권리 중 과도한 것들을 줄여가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권의식'이 아닌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원이 '특권'이 아닌 의무에 따른 '권리'를 누리는 20 대 국회가 되길 바라며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1: newswinkorea.com
3: koreatimes.net
4: m.mk.co.kr



조형원(연세대 식품영양 4):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을 되살리기 위한 20 대 국회의 성공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중의 인구재앙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20 대 국회에서 정책 경쟁의 원칙, 공감대 형성의 원칙, 균형 잡힌 사회통합 원칙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20 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출산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여성과 가족의 입장에서 정책을 다시 만들고, 출산 장려를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의결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삶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 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복지 제도를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제도에 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청년과 여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영(덕성여대 아동가족 3): 저는 어린이집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설 어린이집은 아침 9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는 워킹맘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자 위주가 아닌 워킹맘 위주로 운영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아침 7 시부터 밤 9 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2 교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2 교대로 인해 늘어나는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도 늘어나고 워킹맘의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워킹맘들이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설효진(국민대 경영 2): 저는 직장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증가하면 워킹맘 입장에서 출퇴근을 아이와 함께하고 직장생활 틈틈히 아이를 볼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수한 여성직원들이 걱정없이 일에 전념하는 만큼 회사 또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비용과 장소, 대상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습니다. 게다가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규제 또한 만만치 않아 설치를 포기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20 대 국회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김민진(명지대 사회복지 3): 저는 출산휴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을 제외하면 출산휴가를 법대로 안 주는 기업이 많고, 심지어 출산 시 퇴사를 강요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출산이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는 의식이 팽배해졌고 이는 출산률 저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률 개선으로 안정적인 출산휴가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출산휴가에 따른 비용과 인력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빈 자리에 신규 채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경영자와 나머지 직원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급여를 정부가 100% 지원하고, 임시 파견근로를 허용해 출산휴가자의 빈 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영빈(중앙대 의예 1): 저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 당 양육, 교육비가 2 억에서 4 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양육비의 원인은 상당수 사교육비 지출 때문입니다. 20 대 국회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서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채다혜(한국외대 이탈리아어 3): 저는 집값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 내집 마련에 8.9 년이 걸리고 내집 마련시 집값의 30~40%의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월세와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 부부들의 출산률이 낮아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20 대 국회에서 집값 하락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교육비 감소를 통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조형원(연세대 식품영양 4): 오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의견, 출산휴가 정비에 대한 의견, 교육 및 주거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복지제도 정비가 출산률 증가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성과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다시 만들 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20 대 국회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서 대한민국의 국운을 되살려 놓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진 1 출처: http://m.bokjiro.go.kr/wellnfo/retrieveGvmtWellnfo.do?wellnfSno=250
사진 2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aJPe&articleno=181
사진 3 출처: http://hanliu-123.tistory.com/87
사진 4 출처: http://m.bokjiro.go.kr/wellnfo/retrieveGvmtWellnfo.do?wellnfSno=250
사진 5 출처:
http://whitegle.tistory.com/entry/%EC%8D%B0%EC%A0%84%EC%A3%BC%EC%9D%B8%EA%B3%B5%EB%93%A4%EC%9D%B4-%EB%A7%90%ED%95%98%EB%8A%94-%EC%82%AC%EA%B5%90%EC%9C%A1

④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주영(명지대 국문) :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셔서 바쁘신 와중에 토론에 참석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3 차 선진화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413 총선으로 꾸려진 20 대 국회가 오는 6 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힘써주기를 바라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통일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머지않아 통일 한반도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물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점점 경제수준에 비해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정신문화의 발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 한반도 시대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한민족의 언어와 사회문화, 풍습 등을 돌아본다면 균열된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어떻게 하면 통일 한반도 시대를 이끌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성신여대 법학) :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모두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남한과 북한만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사의 경우, 대대적인 시스템을 통해 제대로 교육하고 또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생애에 대해 연구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려고 그가 머물렀던 중국의 한 지방엘 갔지만,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태이고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기 힘들다는 중국 측의 답변을 보고 많이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처럼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남북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있는 한인 학자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학자들의 연구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등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홍승희 (국민대 법학)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나서서 파묻혀 있던 진실을 찾는 것은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역사학자들이 숨겨진 역사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교육도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모 프로그램 역사퀴즈 코너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고 '긴또깡'이냐며 되묻는 등 수준 이하의 역사 지식을 보여줘 네티즌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학창시절, 주변 친구들도 영어 단어 하나 잘 모르고, 수학 문제 하나 제대로 못 푸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 하지만, 기본적인 역사 지식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입시 위주의 공부가 중심이 되다 보니 정작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 등 전통 교육도 필요합니다. 민족 정체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큰 혼란 없이 기쁜 마음으로 통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한 한민족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박은지 (성신여대 교육학) : 저도 통일을 위한 역사, 전통 교육 부분에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학습이나 드라마, 영화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한 교육도 학교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많은 사극 드라마들을 보면서 컸습니다. 그 중에서는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들도 많지만, 재미를 위해 과도한 역사 왜곡과 고증 부족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준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퓨전 사극 등 재미 위주의 장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정극을 모토로 한 사극이라면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와 전통 교육이 있다면, 집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좀 더 편하고 쉽게 역사와 전통을 배웁니다.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전문 기관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 더욱 질 높은 역사, 문화 컨텐츠를 생산해야 하는 것이 컨텐츠 제작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노력을 통해 혼란 없이 통일 한반도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영 (명지대 국문)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통일 한반도 시대를 이끌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봤습니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처럼 통일 한국을 내다보며 정신적인 토대를 닦는 작업이 20 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다면 통일 후 발생할 여러 혼란들을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⑤ 영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남북 표준 통합은 남북통일의 기반이다!

김주헌(영남대 국사 4) : 안녕하십니까?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학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남북 표준 통합을 통한 통일한국의 기반 건설'입니다. '통일'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서 차근차근 실천하며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남북 표준 통합보다 더 중요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 등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단 70 년이 지난 지금, 분단의 고착화가 되지 않기 위해 국회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남북의 표준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통일 후 10 년간 77 조~350 조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며 RAND 연구소는 50 조~670 조라는 한반도 통일비용이 나올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서독 역시 통일비용으로 1 조 마르크(약 400 조 원)을 예상했지만, 1990 년 통일 후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분단이 된 상황에서도 방송 표준 등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표준 통일 비용은 180 조 원이 소요되어 전체 국가 통일 비용의 약 10%나 들었다고 합니다.

남북통일의 통일 비용 절감 및 한반도 통합을 위해 남북 표준 통합을 이루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특히 진정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이번에 출범한 20 대 국회에서의 법안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목(영남대 정치외교 2)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ISO 에서 제시하는 전반적인 표준을 지키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표준 제정을 고치는 것보다 북한이 표준 통합을 따르지 않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북한과의 학술교류 등을 통해 국제적 표준을 따를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용(영남대 역사 2) : 한글의 사용에 대해서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ISO 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쓰는 표준어를 인정했다. 그 이유는 언어에 있어 남북한의 격차라고 생각한다. 언어의 표준 통합은 남한 표준을 강요하기에 다소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다. 그래서 남북의 합의를 통해 언어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한어	북한어	남한어	북한어
개구쟁이	벌개돌이	소매치기	따기꾼
거짓말	꽝포	어리숙하다	어질거리다
구설에 오르다	말밥에 오르다	창피하다	열스럽다
괜찮다	일없다	화장실(화장지)	위생실(위생지)
나들이옷	갈음옷	치킨	닭유찜
누룽지	가마치	네비게이션	없음(길안내기계로 설명)
덜렁거리다	건숭맞다	백신(vaccine)	왁친
소라	바다골뱅이	힐 체어	삼륜차/불구자용 밀차

남북한의 언어 표준화, 통일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경수(영남대 역사 1) : 남북한의 언어 표준화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북한언어를 사투리식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급진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점진적인 표준화를 추구하며 표준어와 사투리로 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지연(영남대 정치외교 2): 저 또한 언어의 표준화를 찬성합니다. 북한입장에서는 평양의 말이 표준이고, 남한의 입장에서는 서울이 표준입니다. 저는 '겨레말큰사전'을 발간 등을 통해 서로의 단어 차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민(영남대 역사 1): 우리나라 표준말 자체가 너무 서울 중심이기에 수직적인 느낌이 듭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 표준어가 아닌 '보통어'라고 쓰며 다른 지방과 쓸 수 있는 유지책이 있습니다.

신동혁(영남대 역사 2): 역사교육에도 표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한 내부의 합의와 북한 내부의 합의를 통해 역사교육을 표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독도문제를 시작하여 공통된분모를 통해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역사교육의 표준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목(영남대 정치외교 2): 영화촬영에 있어서도 남북의 표준이 다릅니다. 통일이 되어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분명히 북한 역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체제 내에서는 그들의 실력을 발휘하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북의 철도 표준화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필연적인 요소이다

김주헌(영남대 국사 4): 이제는 산업의 표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철도부분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용(영남대 역사 2): 철도표준은 남한에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경우 90%가 단선입니다. 북한 철도는 선로가 하나밖에 없기에 상·하행선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철도표준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중국과도 맞지 않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에 철도표준은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국회에서의 법안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정민(영남대 역사 1): TKR(한반도종단철도)를 연결하려면 박준용 학우가 주장한 방안대로 철도 표준을 우리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2015 년 8 월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전쟁으로 유실된 철도를 복원하면서 점진적인 표준화를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경수(영남대 역사 1): 철도표준을 실현함에 앞서 지명표기도 표준화를 해야 합니다. 평안북도 등의 큰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되, 김책시 등 정치적인 지명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명과 함께 도로명주소를 도입하여 편리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동혁(영남대 역사 2): 우편번호 및 우편배송에도 표준이 필요합니다. 우편배송을 하려면 도로 역시 표준화를 해야 하고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표준을 행해야 합니다. 아직 저희가 갈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김주헌(영남대 국사 4): 표준 통합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잘 소화하신 영남대 학우들에게 진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통일 국가가 되기 위해서 표준 통합은 필수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학우들이 제언을 바탕으로 법안을 제정하여 좀 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사진 2 : 아주경제
사진 3 :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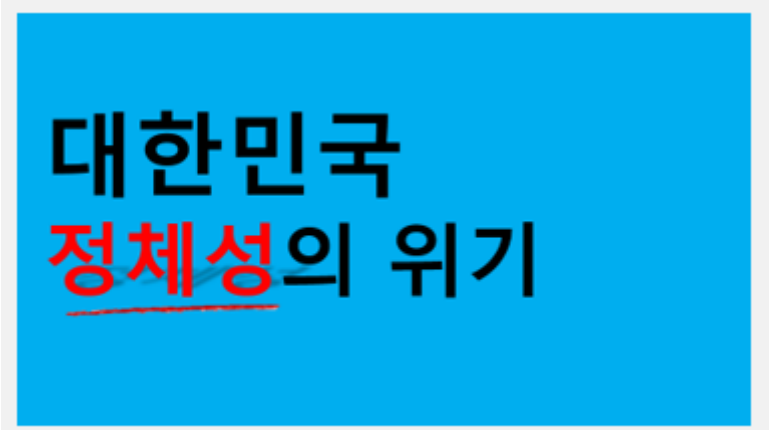
⑥ 경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효원(경상대 건축공 4) :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문화뿌리를 알고계신가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기까지 많은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선진국의 좋은 제도, 문화들을 받아들여 빠른 속도로 독보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제도와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독창적인 해석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함으로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국가들의 문화를 선망하고 따라하는 버릇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20 대 국회에서는 문화뿌리를 되찾아 문화강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우리 고유의 문화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문화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로 정체성을 회복하자.

강효빈(경상대 건축공 4) : 그 동안 우리가 선진국 제도와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되면 색깔 없이 전부 따라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수용하는 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색깔을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동이 바로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솔미(경상대 건축공 4) : K-POP 이 흥하고 한류가 유행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는 한류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류가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한류를 통해 우리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강국입니다. 20 대 국회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고, 파급성이 좋은 인터넷과 SNS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에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우리의 고유한 문화뿌리를 되찾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고 문화교류를 활성화하자.

정다운(경상대 건축공 4) : 강효빈 학우의 따라 하기 문화가 정체성을 사라지게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도시마다 해마다 여러 축제를 개최하지만 인기가 있고 솔직히 말해 돈이 된다고 생각되면 너도나도 따라해서 지역만의 특색 있는 축제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다른 나라를 보면 스페인 토마토축제, 브라질 리우카니발축제, 독일 옥토버페스트 등 각 지역의 색깔이 담긴 축제가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했지만 우리나라는 대표할만한 축제를 손꼽을 수 있나요?

대답은 NO 입니다. 계속 축제를 상업적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지역 축제 따라하는 것에 급급하면 지역의 특색도 없어지고 지역축제 의미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 대 국회에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려 지역만의 개성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박소연(경상대 건축공 3) : 지역만의 개성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운영에 있어서 보다 지역축제를 트렌디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에도 논개제를 매년 개최하지만 축제 이용객을 보면 젊은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축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축제들을 보면 관람객이 되는 축제가 아니라 스스로 직접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를 트렌디하게 바꾼다면 남녀노소 모두 주체적으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프로그램이 좀 더 다채로워져서 축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 지역 간의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효원(경상대 건축공 4) : 지역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에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문화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도시와 소도시 간의 문화격차가 점점 커진다면 우리의 문화뿌리를 회복할 수 없을뿐더러 국민이 화합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 대 국회에서는 '풀뿌리문화신경망'을 구축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 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문화교류가 늘어나게되면 문화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적 공유와 화합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우리의 고유한 문화뿌리를 회복해 나라의 하나 됨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뿌리가 기반이 되어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만의 색깔로 재탄생시켜 또 하나의 독창적인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임수연(경상대 건축공 4) : 저도 우리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 대 국회에서는 우리 고유의 문화뿌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에 힘써야합니다. 지역 축제나 문화재, 관광지 등에 대해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고 친근하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문화 분야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 광고, 프로그램 등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문화지원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부족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지역문화 광고를 공익광고처럼 TV 나 라디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 문화도 발전하고 문화교류도 활성화 되고 문화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원(경상대 건축공 4) : 여러분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서 기반을 다지기위해 20 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문화뿌리를 되찾는 것이 우선이고, 남을 따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하며 고유의 색깔을 찾아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간의 문화 교류를 통해 불균형한 문화 격차를 줄이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인터넷과 SNS 를 적극 활용해 문화를 형성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우리 고유문화를 재정립하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가 창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선진문화를 쫓아가는 모습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강국으로서 앞서나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뿌리의 회복과 융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 대 국회가 문화강국의 기반을 다지는 것에 노력해 우리의 고유한 문화뿌리를 되찾음으로서 잃어버린 정체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⑦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 서강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잠재성장률의 추락과 심각한 분배의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일 것 같았던 단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5%라는 사상최고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규제혁파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부분의 4 대 개혁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구조개혁과 규제혁파에는 너무도 많은 저항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4.13 총선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짐으로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20 대국회 개원 초기 일사분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회에 입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성빈(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 저는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생들 속에서부터 구조개혁과 규제혁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입법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100 만 서명운동을 벌려 20 대국회에 입법하도록 재촉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3사 부터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김인호(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 또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케이블 TV 뿐만 아니라 지상파에서도 집중적으로 몇 주만 구조개혁과 규제혁파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론화를 해서 20 대국회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이건희(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1): 물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자금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SNS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NS 홍보는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허남규(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 물론 대중적 홍보나 서명운동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의 피부에 구조개혁과 규제혁파의 중요성이 와 닿게 하려면 다소 적은인원이라도 직접국회에 가서 시위나 집회를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작은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보가 큰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위나 집회도 필요하다

김민석(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 저는 시위나 집회는 큰 효과가 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시위나 집회가 매일 일어나다시피 해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호영(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 제 생각에는 홀로그램 시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월 24 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이번 집회는 홀로그램 시위로 기획됐으며, 국내에서는 첫 시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지난해 4 월 스페인에서 열린 홀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이렇게 아직 홀로그램 시위가 일반화되지 않아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입법 촉구 홀로그램 시위를 한다면 홍보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이봉범(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 구조개혁을 하면 일자리를 잃는 식의 불이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익손실집단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20 대국회가 구조개혁을 속도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손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최규식(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큰 저항세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들의 이해관계를 발동시켜 그들 스스로

구조조정에 앞장서도록 해야 합니다. 즉 구조조정의 주체가 국회라기보다는 이익손실집단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영원히 없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구조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 여러분의 활기찬 토론 감사합니다. 규제혁파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너무도 많은 저항세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권초기, 국회개원초기 국민공감대를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 대선정국을 고려할 때 국회개원 후 금년하반기가 마지막 골든 타임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개혁과 규제혁파의 중요성을 대학생들 뿐만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서명운동을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20 대 국회 초기부터 민생현안들을 해결한다면 새 국회가 일하는 국회,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2 차 서강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⑧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재환(동아대 무역 2):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입니다. 필연적인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무한 경쟁으로 경제는 성장했지만 경제 외 문화 같은 분야에서는 아직 빈약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화 선진국들을 모방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라가 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한민국'만의 문화를 독자적으로 발견해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수도권 중심으로만 정체되어 있는 문화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문화강국 건설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남진(동아대 무역 3) : 저는 지역적 문화 특색을 살리기 위해선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은 옛날부터 지역의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예술 공연을 하고 보고 즐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대형마트에 점점 밀리면서 전통시장이라는 색깔 또한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효력은 미미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만의 문화적 특색을 살린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의 입지, 역량 등에 따라 지역의 문화 관광 특산품과 연계해서 관광과 쇼핑 같은 관광시장 문화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동아대 무역 1): 저 또한 동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시장 상인들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공간인 전통시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지역 사회에 튼튼하게 뿌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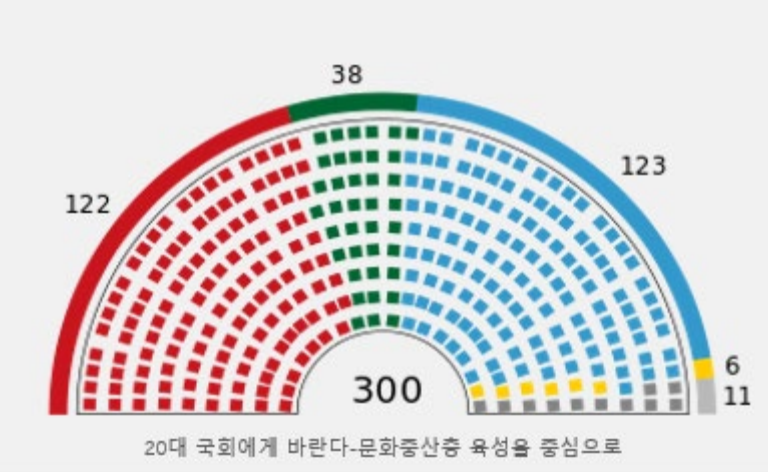
박주영(동아대 무역 2):저는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의 '지역 축제' 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지역축제들이 있지만 독일의 '옥 토퍼 페스트 축제', 중국 하얼빈의 '얼음 축제' 같은 브랜드화된 지역축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역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축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정책들과 축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지윤(동아대 무역 1): 저는 단순히 특산물, 축제보다는 '농촌, 어촌 체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잘만 활성화되면 곧 관광사업으로 이어지고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환(동아대 무역 2):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 3 차 동아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문화강국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브랜드로서의 축제, 지역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⑨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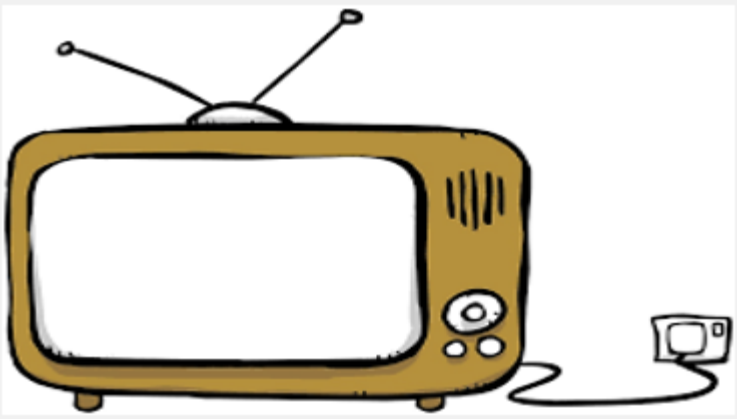


20대 국회에게 바란다-문화중산층 육성을 중심으로

정승훈(단국대 철학 4): 흔히 권력의 삼권분립에 있어서 사법부는 공동체 구성원의 과거의 일을, 행정부는 현재의 일을, 입법부는 미래의 일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특히 입법부는 국민의 '꿈의 공장'으로서 이 기능을 수호하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최근 '식물국회', '운동권 정치'라는 오명을 쓴 19 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새로이 20 대 국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옛 격언도 있듯 이번 20 대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높습니다. 특히 여소야대를 만든 정국으로써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대해 단국대 내에서 '문화부분에서 20 대 국회에 바란다- 문화중산층 육성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중산층이란 문화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중류계층을 뜻합니다.


TV개혁이 시급하다

이상목(단국대 사학 4): 저는 텔레비전이 문화 교육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여러 케이블 채널이 국민의 의식과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 대 국회에서는 TV 개혁을 주제로 입법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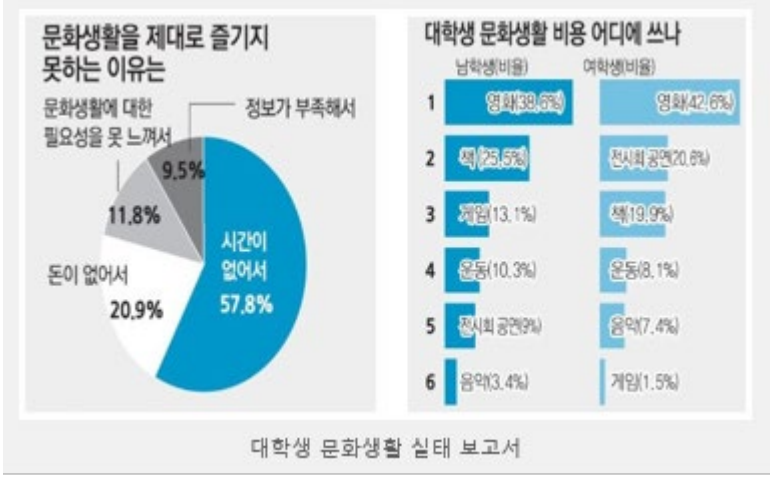
김현중(단국대 법학 4) :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기호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트랜드가 자신의 개성에 따라 소비하기보다는 타인이나 대중의 기호에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의 집에서 강습을 한다거나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김태연(단국대 행정학 4): 네이버 캐스트에서는 "열린 연단"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서 저명한 학자들이 정치/경제/철학에 대해서 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코너에서도 문화의 상류계층이 대중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원(단국대사학 4) : 현재 학업과 취업의 중심으로 바뀌면서 문화를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합니다. 인문중심적인 사고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중심적인 사고가 발전되어야 문화가 발전합니다.

미국의 컨텐츠 경우 다양하고 심도가 있습니다. 규제는 스스로 만든 것이지 그 틀을 깨는 것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문화산업에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TV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허슬람(단국대철학 3): 근대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문화의 생산수단의 소유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SNS 를 통해서 세상을 접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수단의 소유는 가능하나 그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교육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민우(단국대 경영 3): 미술이나 음악은 전공에 따라가서 보고 일반 타과생들은 보고서나 과제에 따라서만 이러한 문화활동을 합니다. 대체공휴일에도 사람들의 소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소득이 100 만원 미만은 5.2%, 서양음악 1.8%, 영화 17.7%이지만 600 만원 이상은 미술 18%, 서양음악 13.1%, 뮤지컬 25.8%, 대중음악 22.6%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소득상위 20%가 문화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연령별 소득별 누리는 문화가 다릅니다. Kpop 과 한류문화가 커져가고 있는 만큼 문화적 자생력과 그 넓은 범위의 문화보급확대 및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가시간과 소득수준과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전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이지만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프랑스같은 경우 매주 일요일에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불우이웃이나 장애인, 맞벌이 부부에게는 커다란 사치가 되고 있는데 국가가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적극 나서야합니다. 문화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의식고양과 트랜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동욱(단국대경영 4): 독립적으로 소수 영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대형 기업체에 의해 문화가 형성되고 나아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광고산업이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 광고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1980 년대에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한국방송공사를 만들어 규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프로그램뿐만 아닌 부수적인 패키지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한도가 무분별합니다. 광고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중간광고가 필요합니다.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KBS 도 연간 적자가 500 억에 달하는데, 광고산업이 바로 서야 고품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광고사가 자체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시도에 대해 주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광고액으로 평가받는 슈퍼볼 광고단가

감현중(단국대 법학과 4): 미국의 수퍼볼 광고가 억단위가 넘어가는데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광고를 내는데 이는 문화컨텐츠 발전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슬람 (단국대 철학 3): 자신의 예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고 그 마인드도 확립되어야 합니다. 정치문화에서도 시민문화, 민주주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사회교육, 법교육은 받으나 시민으로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동교육, 노사협상 등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현실입니다. 이는 노동권익이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공정성 역할이 부족합니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권력문제로 특정문제에 대해 객관성과 알 권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김지원(단국대 한문교육 4): 일반적인 능동성과 주체적인 의식은 시민의식과 기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에 있어서 영화나 음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홍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파적인 문화에 대해 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호재(단국대 정치외교 3): 의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노동자라는 것은 노동을 통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의식적으로 노동자라는 개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 바라는 점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도 한계점이 있듯이 교육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체험과 경험이 중요하며 교육의 진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윤(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 4): 쉴러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국가는 이성적이지 못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미적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나은국가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체험적교육과 개념적교육이 합쳐져서 미적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목(단국대 사학 4): 소득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문화를 권장해 줄 만한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합니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⑩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주아람 (건국대 경제학 4): 지금부터 건국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가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그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있던 문화 부문에 대한 개혁을 제시해보고, 향후 20 대 국회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문화경쟁시대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한 문화 정책들을 자유로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문화적 갈등을 벗어나 공유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인 문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야 말로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의 지역적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적 특색을 살린 특산물과 향토 유적지, 특색 있는 자연 경관을 테마로 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소규모 촌락이나 지방에서의 문화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자유로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선 교통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김가은 (건국대 경제학 4): 상대적으로 문화 시설과 접근성이 낙후되어있는 지역 자체적으로 문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 산업을 기획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합니다.

우선 이러한 문화산업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려면 근본적으로 지역 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20 대 국회는 문화 산업 발전에 있어 사회적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것부터 힘써야 합니다.

'교통편의 확충'은 대도시든 촌락이든 문화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 문화 테마파크나 문화 단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힘들다면 관광객들에게 외면 받는 건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체험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김은서 (건국대 경제학 4): 맞습니다. 이렇게 교통편 등의 기초적인 기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마을과 마을, 지역과 지역 간 문화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도 좋은 정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규모 박람회를 함께 개최하는 것도 좋고 여러 도시들이 연합하여 새로운 문화 센터나 시설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개발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 산업의 컨텐츠들은 그 특성상 '무형재'의 재화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많이 들 수 있으나, 한 번 개발된 컨텐츠들은 적은 비용으로 넓은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며 여타 업종들과의 연계성이나 확장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드는 막대한 문화 컨텐츠 개발 비용은 여러 촌락 간 공동 투자와 개발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공동의 문화 개발은 낙후 지역에 대한 문화 시설 유치 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다양화를 통한 문화의 질적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를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개발하자.

백민희 (건국대 응용통계 4):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향후 주목할 만한 새로운 문화코드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 시설과 프로그램을 고안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류 드라마와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를 관광지로 개발한 곳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을 지역 고유의 스토리와 엮어서 독창적인 문화 시설로 만들어내는 일은 미흡한 편입니다. 정동진의 모래시계 공원처럼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를 지역 특색에 맞게 '스토리텔링'하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촬영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드라마와 영화와 관련하여 명대사와 명장면 등을 직접 체험해보고, 촬영지 테마를 한껏 살려 주변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시설과 조화를 이루며 조성한다면 관람객들은 마치 영화와 드라마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가상현실체험기기를 활용한 문화 체험 관광의 활성화

오재선 (건국대 경제학 4): 전통문화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 산업 개발과 한류를 활용한 영화, 드라마 컨텐츠 말고도, 저는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과 지역의 역사와 향토 유적지를 접목하여 새로운 문화 코드를 창출해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도 꾸준히 개발되고 여러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한 가상현실체험기기인 'VR'을 활용해 지역 고유의 역사와 향토 유적 스토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한편으로 아이들에게 게임 산업을 활용하여 생생하고도 재미있는 역사와 전통 교육의 장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아람 (건국대 경제학 4):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글로벌문화경쟁시대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 20 대 국회에게 바라는 문화 정책의 방향성과 대안들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문화시설에 대한 특정 지역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시설의 확충과 같은 기반 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역 문화 클러스터의 구축, 영화와 드라마, 게임 산업과 지역 특유의 문화와 전통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 코드에 주력한다면, 분명 다가오는 20 대 국회에서, 성공적인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화 과제 27:

인성교육,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제 77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강명재(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사람의 인성교육은 예술적인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 일변도의 학교교육에 따른 인성교육의 실종. 말로만 많이 들었지, 이에 따른 결과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 같았다는 유서를 남기로 자살한 학폭 피해자 학생들의 뉴스를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현행 인성교육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인성교육의 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7 차 교육과정부터 재량활동이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창의적 체험활동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학교장 재량으로 독서교육 활성화나 학교폭력 금지운동을 벌이는 곳도 많습니다.

교과활동에서도 도덕 및 윤리과는 학생의 인성을 교육하는 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접근의 방식이 문제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은 집체형의 단일식 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의 암기식 수업을 인성교육 부문에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학생들의 인성에까지 닿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죠.

인성교육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을 다루는 일이므로 신중하고, 장기적이며,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틀에서 벗어나서, 학생의 인성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교육과정에 같이 버무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감성을 다뤄야 하는 교육은 따라서 매우 예술적인 일입니다. 사람을 교육하기 때문이지요. 지덕체를 고루 함양한 전인교육이 교육의 목표라면, 이를 균형 있게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은 그야말로 예술에 버금가는 활동입니다.

인성교육도 이러한 교육철학 내에서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독일에 자유 발도르프라는 종합학교를 아시나요?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보는 교육의 핵심은 자연을 닮아가는 인간 교육입니다. '감성 교육'이라고 흔히 칭해지는 발도르프 교육은 아이들의 영혼을 신장시키는 수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예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발도르프 학생들은 아침 등교 후 선생님과 같이 철학적 내용이 담긴 시를 낭송합니다. 수업은 음악과 미술 등 철저히 예술로 지식을 승화시키죠.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는 예술을 통한 '감성교육'을 시행한다.

음악의 높낮이를 몸으로 표현하거나 수학의 연산기호를 미술처럼 근사하게 그려내고, 몸으로 직접 예술작품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단계에 알맞은 감성 자극으로, 발도르프 학생은 감성, 인성이 모두 풍부한 성인으로 자랍니다.

요즘 인성교육은 '창의, 인성교육'으로 창의와 함께 쓰입니다. 발도르프의 사례처럼 아이들의 감성을 북돋아 주는 교육은 아이의 인성뿐 아니라 창의성까지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智德體 삼 요소 중 智만을 좇는 현재의 교육은 감성교육으로 다시 탈바꿈하여 智德體를 모두 겸비한 전인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와 학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학원은 직업에 관련한 기술을 '훈련'하는 기관이지 '교육'을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반면,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앞서 말한 지덕체를 고루 함양할 수 있는 인간 육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공부하는 것을 따로 떼어 생각하시나요? 공부는 어떤 특정목표를 위해서만 하는 내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인해 내 미래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앎과 삶의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나와 지식의 관계는 '나-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너'의 상호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기존의 내용위주 인성교육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발도르프의 예술교육과 같이 방법론적으로써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성교육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서 교육을 다시 한다는 접근보다, 오히려 기존에 진행되어 온 교육과정의 방법을 새롭게 강구하는 것이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곧 인성교육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② 김영재(삼육대학교 경영학과)



감사나눔 운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인성교육을 시작합시다.

지난 5 월, 한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 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동영상 속에선 학생들이 환자복을 입으신 할머니에게 “여봐라, 네 이놈.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라고 반말로 소리를 지르거나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라며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만화의 대사를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속의 배경은 노인 요양시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소속 고등학교에서 상습 흡연 등의 이유로 교내 봉사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태도가 바뀌지 않아 외부 봉사활동을 조치를 받은 상태였는데 이런 동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직접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학생과 학교 측을 강하게 비난했고, 학교 측에선 학생들의 중징계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 5 대 범죄라고 불리는 살인 • 강간 • 강도 • 절도 • 폭력 부문에서도 청소년 범죄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흔히 청소년들은 국가의 미래 그 자체이자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라고 합니다. 그런 인재들이 점점 어긋나고 있는데 그저 사춘기라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청소년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인성이라고 말할 겁니다. 인성은 사람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다 큰 성인은 인성교육을 받아도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청소년 성인이 되기 전의 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많은 부분이 집중되고 있어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위주 교육 시스템의 변화겠죠. 하지만 좋은 대학은 성공이라는 공식이 사람들의 인식에 자리잡은 사회에서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만 하는 바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일정한 시간을 할당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혹시 행복나눔 125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행복나눔 125 운동은 감사나눔 운동이라고도 불리는데, 행복나눔 125 운동의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주 1 선행, 한 주에 1 번 이상 착한 일을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뿐만 아니라 동료가 어려워하는 일 묻고 돕기, 힘든 사람 격려하기, 발전적인 제안하기, 정리 정돈하기 등 '착한 행동'을 일상적으로 의식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1 월 2 독서, 한 달에 2 권 이상 책을 읽습니다. 독서모임이나 독서토론에 참여하면 다양한 생각이 공유되면서 열린 소통이 이루어져 조직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1 일 5 감사, 하루에 5 가지 이상 감사제목을 찾아 적습니다. 행복나눔 125 운동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선행을 하게 되고, 선행이 늘어나면 독서를 하는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선행이나 독서에 비해 감사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습관으로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됨으로써 청소년에겐 가치관과 인성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125 운동을 하면서 드는 시간과 비용이 독서를 제외하면 거의 들지 않는다는 부분이, 바쁜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점입니다.

125 운동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 역시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포항시와 포스코, 해병대 1 사단 등 포항을 중심으로 시작된 125 운동은 현재 전국 기업 및 학교로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이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어디에 풀지 몰라하다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인성교육은 많은 어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형식적인 인성교육을 지겨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25 운동 같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지루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인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견인차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③ 김우갑(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인성 교육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노인에게 욕을 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인성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SBS 의 TV 프로그램 중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아시나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전문가가 인성이 부족한 아동의 모습과 부모님의 대응 방식을 관찰하고, 아동이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는 부모님에게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식을 알려주어 아동의 인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모의 대응 방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폭군이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순한 양이 되어버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아동의 잘못된 행동은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제대로 된 양육 방식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고, 그로 인해 아동의 인성이 잘 갖춰지지 못하고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입학하기 전 처음으로 인성 교육이 행해지는 곳이 가정이고,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점을 볼 때, 인성 교육에 있어서 가정, 특히 부모님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올바른 양육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죠.

요즘 시중에는 양육 방식과 관련된 서적이나 비디오가 출시되어 있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맞벌이 가정인데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절반 정도가 맞벌이 가정이라고 하니 숫자가 엄청나죠.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양육 법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읽거나 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의 양육 방식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양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아이에게 무관심하다고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올바른 양육 방식을 모를 뿐 아이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이의 양육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각종 세금 고지서에 남는 여백을 활용하여 제대로 된 양육 방식을 프린트하는 것입니다.

고지서 요금을 확인하면서 아이에 대한 올바른 양육 법도 간단히 알 수 있고, 나중에 프린트 된 것들을 하나로 엮으면 책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 맞벌이 가정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 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회사나 주민 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 법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교육을 문화센터나 기업 복지 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러한 가이드 라인을 잘 숙지하는 동시에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고, 책을 읽어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올바른 인성을 지닌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 되어서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인성 1 위 국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④ 김재혁(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배려'를 강조해야 한다.

얼마 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죠. 한 아버지와 아들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사주려고 했는데 마침 돈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같이 있던 부인에게 집으로 가서 부족한 돈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인이 떠난 후, 편의점에서 아들과 같이 부인을 기다리던 이 아버지는 몇몇의 청소년을 보았죠.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편의점 앞에서 침을 뱉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버지는 평소 정의감이 투철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표창도 받았을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 침을 뱉지 말라고 나무랐죠. 그러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고 이 아버지는 2명의 청소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6 살짜리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이 아버지는 결국 머리를 크게 다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통제력을 잃은 폭주 기관차 마냥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웃어른의 충고와 조언에 너 같은 꼰대 따위가 무슨 참견이냐며 시비가 붙고 폭행으로 이어지는 각박하고 통탄할만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의 목숨을 잃게 할 만큼 통제력을 잃은 폭행행위에 너무도 경악스럽기만 한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비이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업화 및 개인주의화가 두드러지면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강해졌고, 무엇보다 학벌과 외형주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성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라나는 아이들을 비롯해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예비 선진 시민으로 자랄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인성의 결여 항목으로 저는 배려심과 자기 절제력 (Self-Control) 을 들고 싶습니다.

배려에는 두 가지의 배려가 있는데요. 적극적인 형태의 배려와 소극적인 형태의 배려가 있습니다. 남에 대한 사랑, 돕기를 하는 것이 전자이고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후자입니다.

사회 제도적으로만 보면, 자 유주의 사회에서 어느정도 소극적 배려는 강제를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 배려는 그렇질 않죠. 그러다보니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유주의 사회에서 사랑과 나눔이 별로 활발하지가 않아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문제는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일련의 모습들이 적극적인 배려는 많이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배려를 경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형적으로 보이는 적극적인 배려는 많이 신경을 쓰지만, 소극적인 배려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뛰놀아도 이를 제제하지 않는 어른들의 풍토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죠.

그러나 삶의 덕목문제로 보자면, 적극적인 배려보다는 소극적 배려를 먼저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극적 배려를 증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 절제력 (Self-Control) 을 키워야 하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배려'를 강조해야 한다.

자기 절제력, 다시 말해서 자기 통제력 역시 이중적입니다. 자제력을 얻기 위해 통제하는 고급자아와 통제받는 저급자아가 있죠. 고급자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자기 통제력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때는 엄마가 칭찬해주면서 고급 자아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도하고, 혼을 내면서 저급자아를 통제하는 버릇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성장과정의 기나긴 기간에 고급자아가 생겨나서 저급자아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급 자아가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자제력이 잘 자라나질 못합니다.

고급자아가 너무 높아지면 자기실망감이 커지고 심하면 자학하게 되죠. 반대로 고급자아가 너무 낮으면 저급자아와 쉽게 타협해버려 마구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자아와 저급자아가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현실감있게 위치를 잘 잡아야하고 삶의 과정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고급자아와 저급자아가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서툴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이 내재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욱하거나 신경질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 아이들에게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아이들 버릇을 잘 들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의 신경질을 들어주어서는 안되며,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를 내재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밥상머리교육'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절규범 중에서도 식사예절을 중시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사소한 에티켓에서 이웃에 대한 배려까지 사회인이 갖춰야 할 덕목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절제와 공존 , 품격있는 사회를 유지하는 키워드가 식사문화를 통해 미래세대로 계승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고급자아와 저급자아의 건강한 관계 역시 균형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의 건강성과 격조를 높일 수 있는 손쉽고 효과적인 실천 덕목인 밥상머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는 인성교육의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학업 중심의 교육에서 예술 및 체육에 대한 학업 증진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육체와 자아를 형성하고, 남에 대한 배려와 자기 통제를 놀이나 체육활동을 통해서 발달 및 증진시킬 수가 있죠.

즉,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배려심 증진과 자기 절제력을 체험적으로 익힐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한 산업화 사회에서 한국 사회는 그동안 급속한 개인화 사회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뒷전으로 미뤄두었고 배려심과 자기 절제력을 잃은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고 흉악하고 각박한 세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성교육은 한국사회의 공동체 복원의 열쇠라는 점을 잊어선 안되겠습니다. 21 세기 선진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협동·소통이 강조되는 덕망있고 인간성이 훌륭한 사람이 부각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는 남을 위한 배려심과 자기 절제력을 구비한 아이들이 더 많이 양육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인성교육의 정착, 바로 배려심 증진과 자기 절제력에서부터입니다.

⑤ 김재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과)



아버지의 양육이 아이의 발달을 돕습니다.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와 비윤리적인 행동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인성문제 해결의 주체로 학교, 가정 등이 있는데 아버지는 어떤가요? 아버지도 자녀인성교육에 중요한 주체가 아닐까요?

혹시 'EBS 다큐 프라임-놀이의 반란'을 보셨나요? 그 방송에서는 한국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의 실태와 아버지들이 아이와 놀아주었을 때의 영향력 등을 다루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놀라웠던 점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이의 지능지수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영국 뉴캐슬 대학의 분석 결과, 아버지가 아이 양육에 더 잘 참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지능 지수가 더 높았습니다.

또한, 창의성 전문검사기관인 한국 메사 연구소 서현욱 연구원에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가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아이의 창의력이 증가하고, 아이의 취학 전후에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질 경우, 아이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창의 인성교육'과 OECD 에서 제시한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중 '자율적으로 행동하기'를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자녀 인성교육에 참여하여야 할까요? 먼저, 아버지 스스로가 좋은 인성을 함양하여 아이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혹시 지하철 문 앞 발자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에 9 개 노선 중 절반 정도에 그 발자국이 있는데 그러한 발자국이 있는 노선이 없는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을 잘 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도 스스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좋은 표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와의 대화는 자녀의 창의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에 더하여, 아이의 신체발달과 폭넓은 세계관, 적극적인 성격,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2009 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독서토론과 같은 토론 수업을 늘렸듯이, 아버지도 아이와 대화와 토론을 하는 횟수를 늘려 자녀에게 올바른 인성과 윤리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2010 년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과 아버지의 평균 대화시간은 대부분 30 분도 안되고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도 6.8%나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아버지를 고민상담자로 생각하지 않죠.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는 자세입니다. 아이가 옳지 못한 윤리관이나 도덕적 관념을 갖고 있을 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를 들어주고, 그것이 타당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그것은 '틀렸다', '안 된다'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자녀와의 잦은 체육활동을 통해서도 자녀 인성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전통적으로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많은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살았고 마을사람들끼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서로 돕고, 즐거운 일은 함께 축하하곤 했죠.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산업화를 거치며 개인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가족 구성원은 몰라도 조금만 시끄러우면 그새 달려가 싸우기 바쁩니다.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서로 돕기보다는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활동을 아버지와 함께 할 경우, 그 효과는 친구들과의 체육활동과는 또 다릅니다.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4 월 27 일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풋살 교실을 열어 아버지에게 자녀가 어른과 친구 모두와 협동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을 마냥 아버지에게만 넘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보내야 하는 시간도 많고 그 동안 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따라서 사회도 아버지가 보다 제대로 된 자녀 인성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먼저, 기업이나 정부가 아버지가 자녀 인성교육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최근 기업측에서 가정상황이 직원의 업무효율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각하고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성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고 앞으로도 더욱 장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정부나 혹은 교육기관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 인성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교육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인성교육은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도 이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죠.

서울시는 2009 년부터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을 통해 아버지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들에게 가족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참여자도 많고, 그 결과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참여한 아버지들이 본인이 가족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깨닫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아버지들이 자녀 인성교육에 보다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자녀 인성교육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사회가 올바른 아버지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지난 4 월 13 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가정폭행, 가난 등 다양한 가정사로 가출한 청소년들은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렀습니다. 범죄항목은 다양했고 잔인했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어른들을 피해 아이들이 선택한 생계는 범죄였습니다.

그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과 피디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는데 청소년 사기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잘못됨을 알지만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생계를 위해 다시 이 일(사기)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한편, 이런 비행청소년을 구해준 한 형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사로 방황하던 아이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가 이야기도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며 아이에게 필요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사회는 이렇듯 어려운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아이의 책임이 아닌 만큼 그러한 책임을 사회가 지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가장 먼저, 많은 아버지들이 본인의 가정에서 자녀 인성교육에 참여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아이들도 사회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어, 모든 아이들이 따뜻하고 든든한 아버지 아래에서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⑥ 김혜인(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악당은 스토리를 풍족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악역이라는 방해 요소 없이는 스토리 전개 상의 흥미가 매우 떨어지게 되지요. 실제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이야기에서는 악역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악당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의 모든 악역들의 어린 시절이 불우하게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상영되었던 영화 사상 최악의 악당으로 꼽힌 살인마 한니발 렉터와 조커는 어머니의 학대와 아버지의 폭력으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악당 캐릭터들이 이러한 공통점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당 캐릭터들의 “불우한 유년기” 설정은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우한 유년 시절은 건전한 인성의 형성에 큰 피해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들에서 밝힌 유년 시절과 인성 형성의 연관성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 과 “문화인류학적 요인” 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생물학적 요인이란 대뇌의 전두엽 부위에 손상이 있을 경우 인성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스티븐 앤더슨(Steven W. Anderson)박사의 조사 결과 전두엽이 손상된 사람은 윤리적 판단 능력이 결핍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3~6 세 사이에 전두엽이 일생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단순 반복적인 지식교육보다 도덕성 및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문화인류학적 요인은 사회적 환경에 관련한 것입니다. 이 학설의 대모격인 문화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원시 부족 사회를 관찰하여 인간의 인성 형성에는 부모와 교육자의 영향이 크므로 모나 가르치는 사람, 즉 교사부터 그 가치관을 바르게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이자 사회적 학습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유년 시절에 적절한 인성 교육을 받아야만 바람직한 인성을 갖출 수 있다” 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아이들이 “악당”으로 자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듯합니다.

최근 한국은 인성 교육의 부재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너무 빠르게 진행된 성장 과정에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식의 이기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산업화 사회에서는 인성 교육보다 지식 교육을 중시했기 때문에 인성 확립 문제는 자연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성 교육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인성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인 생물학적 요인과 문화인류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로 전두엽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인 3~6 세를 대상으로 조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조기 교육은 지식이나 타국어 습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풍토의 개선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시행하고, 인성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별 보육원과 가정에 보급해야 합니다.

둘째로 인성 교육을 위한 사회적 학습 환경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학습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 등 인성 교육의 시행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성 교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 정책은 유년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고려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즉 유년기의 경우 인성 교육의 출발점인 가정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에는 교사 교육과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한 학교의 전반적인 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성의 조성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인성 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의 유지 · 강화도 필요합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적 형성된 습관은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처럼 어릴 적부터 인성 교육을 시작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성 교육의 부재로 생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⑦ 백주아(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모 대학의 H 군은 술에 취한 동기생의 옷을 벗겨 추행을 합니다. K 군은 또 그 모습을 신난다고 카메라에 담고 있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M 군은 2 년에 걸쳐 캠퍼스 내 여학생 19 명을 성폭행 성추행하고 여학생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돌이킬 수도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엘리트라 불리며 미래의 촉망 받는 대들보라고 여겨지는 이들의 현실입니다.

애초부터 그들에게 양심(良心)이란 게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소중한 인격(人格)으로 대하며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런 몰상식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대들보가 받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밝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러한 몬스터(monster)를 키워낸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 현행 교육 체계가 인성교육을 소홀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기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수능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성적·입시 위주 교육이 득세하여 학교에서는 오로지 국어, 영어, 수학 등 입시에 중요한 과목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은 수능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 사활을 걸 뿐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선생들 역시 자기 학생의 몇 퍼센트가 명문대에 진학할 지에만 관심이 치중되어 있을 뿐 그 아이의 고민이 무언지, 어떠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기본적인 인간이 지켜야 할 예의와 범절을 충분하게 익히지 못하고 사회로 나오기 때문에 배웠다고 하는 많은 인재들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 아닐까요?

학교라는 곳은 가정과 같이 인간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친구들과의 어떻게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할 것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스스로의 대답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키워주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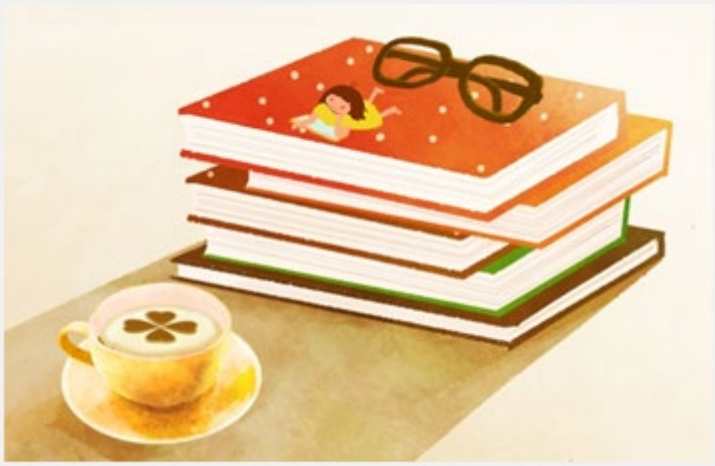
학교는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풀이에만 특화된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미흡한 교육의 체계와 방식과 내용으로 인해 교육 비효율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뒷전으로 밀려난 인성교육,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인문학에 있습니다. 인문학은 다양한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다룸으로서 인간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불러일으키는 발원(發源)이 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 공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세계사,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동양과 서양의 철학의 전통을 접하면서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시야가 점점 넓어지면서 우리는 온 집중을 나 자신만의 세계에 두다가 집중을 서서히 외부로 분산시키게 됩니다.

자신의 본인의 몸체와 또 자신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 대한 관찰, 그렇게 인간이 끊임없이 사색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개인은 자신 외의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성교육은 바로 이 곳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문학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문학 교육의 실정 참 암담합니다. 역사와 윤리 철학 같은 수업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들을 그저 단편적인 지식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수준에 그치며 수박 겉 핥기로 끝나 버리는 일쑤입니다.

심지어 인문학 수업이 수능과는 동떨어져 있다 하여 인문학 수업시간에 주요 과목 자습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은 한 역사적 사실에 담겨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한 인물의 사상을 배우며 옳고 그름에 대한 스스로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인문학 교육이 단발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중등, 고등 교육과정까지 이어지면서 그 수준을 단계별로 꾸준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식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아이들이 이해 할 수 있을 내용이 적절하게 연구되어 인문학 수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책을 읽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친구들과 선생님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서로 타인의 존재에 대해 훨씬 더 쉽게 자각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방대한 지식을 얻고 창의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 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은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꿈을 품고 자신의 끼를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재를 길러 내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주입식, 암기,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은 우리가 추구하는 창의 인성교육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큽니다.

창의 인성교육의 출발은 전인(全人)교육의 기본인 인문학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스스로 옳고 그름과 선과 악과 같은 가치를 탐색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⑧ 손계준(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우리 사회는 '입시형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공부'는, 영어와 수학으로 대표되는 '입시형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작 아이가 바른 인재로 크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성교육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유능한' 인재를 따지는 기준에는 얼마나 업무능력이 뛰어난지, 외국어 능력은 어떤지 등이 중점이 되고 '인성'적인 부분은 거의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성격은 좋지 않아도 일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며 능력만을 강조하다 보니, 조직 내 불화, 갈등, 의사소통의 부재와 같은 문제점들이 속속 발생했습니다.

최근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인성'의 덕목들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직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재교육 받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바로 초•중•고를 거치며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만 있고 인성은 갖추어지지 않은 '반쪽 인재'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성교육은 1~2 년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아이들의 성장기부터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데, 효과적인 현장 교육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개화기 이전까지만 해도 '인성교육'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방과 더불어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전통과의 단절', '지식위주의 교육'이 중시되며 '인성'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인데요,

특히 서구식 근대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별개로 여겼고, 당시 커가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인성과 지식습득은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며 차츰 '윤리적 측면'을 도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당시에 불거진 교육문제에 대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는지, 그의 교육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인성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은 종합 사회교육단체인 '흥사단'의 목적에서,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의 남녀를 단합하여 덕체지 삼육을 동맹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라고 밝히셨는데요,

즉, 건전한 인격의 요소는 덕, 체, 지 이며 아무리 사회 제도를 타파한다 해도 다시금 나쁜 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격혁명'을 통해 조화된 인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격 혁명'의 교육방식은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의 통합을 바탕으로 교원의 인격 강화, 그리고 예체능 등의 '학외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안창호 선생님의 교육방식을 현재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인성교육'이라는 다소 애매한 개념을 단순화하고 현실적으로 구체화해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 '웃어른을 공경하자.'라는 말 대신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자.'와 같이 현실적이고 실생활과 접목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성교육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협동적인 삶이 현실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 단체활동이나 학습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체험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한데, 대다수의 선진국의 경우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한 것을 비추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생활 속의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에 녹아 있는 인성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인성교육은 '윤리, 도덕'시간에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식과 인성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교육이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 '교사'들에 대한 업무 평가에도, 인성적인 측면에서 얼마 만큼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성지향적인 교육을 할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


학생들의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생각을 미리 일깨워줌으로써 흥미를 갖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자아형성에 중요할 텐데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합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⑨ 송현지(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여러분, 학창시절 학교에서 인성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학창시절에 따로 프로그램화 된 인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범대학에서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는 졸업 후에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되고 싶은데요, 학창시절 그리고 대학 재학 중에도 프로그램화 된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제가, 교사가 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과연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최근 인성교육이 교육계의 핫이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목표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큰 축 중 하나가 바로 인성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정착 시켜 성공사례를 늘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학생들의 사건 사고를 뉴스로 접할 때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과연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2013 년 8 월 현재, 새 정부가 출범한 지는 사실상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정부 인성교육의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교육의 효과는 곧바로,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며 더욱이 태도, 가치관, 인성 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 분야의 정책은 정책결정권자들의 임기 동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역대 정권들 가운데 태도, 가치관, 인성 등의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시도한 사례는 많지 않았고, 하나같이 입시제도의 개선만을 중점적으로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습관이나 가치관은 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때가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결정적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체제 하에서 성적으로만 사람이 평가되고 친구들을 경쟁자로 인식해야만 하는 상대평가에 익숙해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인성과 도덕교육은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한다 뿐이지 국·영·수 주요과목만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태반입니다.



국·영·수 주요과목만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태반입니다.

이와 같이 인성교육은 줄어들고 경쟁에만 내몰린 채로 학생들을 방치하게 되면 개개인의 인격 성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 본보기로부터 소외 당하고, 미묘하게 심리적 학대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학습된 폭력이 여러 청소년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 정권과는 달리 현 정부가 임기 중 최대의 교육 목표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을 내세운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표만 거창하게 내세웠을 뿐 이를 위한 내실 있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성 교육의 성패는 '교육이 이루어 지는 곳, 곧 교실' 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리더인 교사들에 의해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나 현직 교사들과 예비 교원들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터라,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가정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학교에서 가르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밥상머리 교육 등을 통해 가정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요즘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변화로 인해 전형적이며 이상적으로 설정된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구조를 갖추지 못한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별거, 실직, 파산 등으로 인성교육은커녕 심리적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조건적이고 비체계적인 인성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심리적 불안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르고 고운말쓰기, 인사하기, 배려하기 등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인성교육에 대한 반발심만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쯤 겪어 보셨겠지만, 선생님이 가진 지식을 토대로 옳은 것들을 나열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을 백마디 듣는 것보다, 학생 본인이 직접 그 참뜻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지죠.

이처럼 배움을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각성과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공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개개인마다 필요한 각성의 지침을 주고 공감을 이끌어낸 뒤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효과적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 학생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가능한 인성교육 전문가가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를 인성교육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사와 예비 교원들의 인성을 직접 함양시키는 것과, 학생들을 인성교육 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을 함양시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와 예비 교원들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사회인 중 한 명이며, 교사의 인품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를 위해, 사범대학과 같은 예비교원 양성기관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특별한 교과과정으로 편성되고 있지 않고, '교육봉사 일정시간 이상 필수' 정도만이 사범대 졸업요건에 포함되어 있는데, 좀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013 년부터는 교원임용고시를 응시하고자 하는 예비 교원은 사범대학 혹은 교육대학원 재학 중 '교직 적성 인성검사'를 반드시 응시하고, 통과해야만 교원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실시하게 된 만큼 아직 문제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교사 선발 과정에 인성 평가의 항목을 넣은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수정·보완되어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성교육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전문교사의 전문지식을 공인해줄 자격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직교사에게는 연수를, 예비교원에게는 관련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전문지식을 공인해주는 등의 체계가 구축된다면, 교사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도 분명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것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도 교육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전문가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은 우리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육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전문성이 잘 인정되지 않는 분야이지만, 이는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육은 철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전문성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바로 현 사회의 교육과 관련한 수많은 딜레마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극적인 성공사례들은 좋은 부모를 능가할 만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교사들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헌신적인 노력의 바탕에 전문성을 장착해야 할 때입니다.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교사와 예비 교원들은 반드시 인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갖춘 후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⑩ 이동석(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대구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1 년, 대구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2 학년이었던 한 학생이 대다수의 같은 반 친구들의 상습적인 괴롭힘 끝에 유서를 작성하고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학교폭력 외에도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나라 중, 고등학교 모습을 보면 온통 성적과 입시뿐입니다. 이런 성적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한창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에 대한 전인격적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인성교육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수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한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나라 학생들의 인성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일선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성교육 방법에 있어 개선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학교 혼자 모두 떠안을 무거운 짐일까요?

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에서는 한 가족에 3 대가 함께하는 대가족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레 인성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것이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간의 유대감이 약해지고 사회전체가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면서 과거와 같은 인성교육이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학교에 전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책임을 떠맡기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나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하는데 있어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 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일선 학교에서 채찍과 당근을 사용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학교에서 대학 진학이 가지는 의미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을 이용한 인성교육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나 기타 다른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한해서는 생활기록부에 분명히 명시해 대입에 불이익을 받게 하고 평소 예의 바르고 생활태도가 바른 학생에 한해서는 장학금을 주는 식으로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 나라 학교의 사정을 생각해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소홀해진 우리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인성교육은 어릴수록 효과적이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행동을 보고 습득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핵가족화와 더불어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예절, 공손, 나눔, 배려, 절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식사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예절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싼 학원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 한 사람의 개인 혹은 기업 등 단체에서의 재능기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멘토 열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실마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명한 저명인사들부터 시작해 사회 공헌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시민단체까지 우리 학생들의 멘토가 되는 방법도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생들과 공감하면서 자신의 경험, 가치관 등을 공유할 수 있다면 학교, 가정에서 하는 인성교육 못지 않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이 곧 우리 나라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학교, 가정, 사회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⑪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과거 60 년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시대에는 사회를 지배하는 슬로건이 효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교육에서도 인성, 전인적 교육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지적능력이 뛰어난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문제 해결의 역량이 뛰어난 인재들은 많이 육성될 수 있었으며 이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투입되면서 한국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이 가능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인성교육의 비중이 낮은 공교육 시스템과 능력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 선발된 인재들의 윤리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회의 엘리트들이 가장 위험한 사회적 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브레인들이 그들의 능력을 사리사욕이 아닌 사회를 위해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조치가 필요할까요?

우선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개그콘서트에서 학생들과 교사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을 풍자한 프로인 '멘붕스쿨'이 인기를 끌 정도로 우리사회에 학생과 교사 간 소통 단절 문제는 크게 이슈화되었으며 해결이 시급합니다.

소통단절이 상호 간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주로 생긴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해결책으로 일방향적, 주입식 방법이 아닌 교사와 학생들의 운동경기, 방과후 밴드 공연 같은 상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대안들이 활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 국가들에 비해 교사 일 인 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서 콩나물 교실이 되어 버린 우리나라의 교육적 환경 또한 학생과 교사 간 소통 단절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제약 조건을 타파하려는 예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콩나물교실' 방식의 수업 환경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졸업 필수 이수과목들 중 '참세미나'라는 강의가 있는데 이 수업의 특징은 한 교수님 수업당 최대 12 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님과 학생들 간 콩나물 교실에서는 불가능했던 실질적인 사제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교수님은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수업은 어떤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들은 교수님의 고충이나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교류가 더 활성화된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스승을 향한 존경과 감사가 생겨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⑫ 이효정(서울대학교 불어교육학과)



교내 교사의 권위 추락이 심각하다.

최근 종영한 '학교 2013'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우리 현실에서 교권 추락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사실적으로 녹여내어 큰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또한 JTBC 에서 기획한 특별 프로그램인 〈우리는

형사다>에서도 형사들이 최근 접수되고 있는 학교 내 사건들을 인터뷰하면서 교내의 교사의 권위 추락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보도했습니다.

계단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나무라는 교사를 폭행하는 정도는 우스운 정도이고, 담배를 빼앗긴 학생이 교감을 무차별하게 폭행을 하고, 여교사에 대한 농담의 수위를 넘어가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교사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보니 일반 학생들마저 교사를 보고 틱틱 튕기고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 년 간 교권 침해의 사례는 신고된 건 수만 해도 무려 5 배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2009 년 1570 건에서 최근 2012 년 7971 건으로 5 배 가깝게 증가, 신고된 7971 건 중에선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4933(6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론 수업진행 방해 등이 있었습니다.

옛말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내 스승에 대한 예의를 깍듯히 차렸던 우리사회의 스승과 제자간의 '존중'의 정신은 왜 이토록 보기 어려운 것이 되었을까요?

원인은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태도들에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인 지지를 얻고, 교내에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넓게 퍼지자 갑자기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마치 권력인양, 교사들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학생들은 자유에는 책임의식이 따라야 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자유스럽지 않은 방종적인 학생들입니다.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사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학부모에 의해서도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식의 얘기만 듣고,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차별하게 교사에게 무차별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몇몇의 학부모들이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는 거죠.

교권이 심각하게 붕괴되면서 이제는 학생을 때리는 선생의 수보다 선생을 때리는 학생의 수가 더 많은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는 걸까요?


교내의 혼란한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미국에서는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을 학교에 배치된 경찰들이 전담하여 해결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경우 교사 개인이나 학교가 그것을 맡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내 경찰과 학생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선생들은 보다 마음 놓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에 경찰을 두는 것과 같은 방식이 우리사회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적절한 대안이다'라는 의견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많지만 오히려 학교내의 문제를 경찰에게 맡긴다고 비교육적이라 지적하는 시각도 따갑습니다.

경찰을 배치하고,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다시 말 듣게 하는 방안들이 어쩌면 지금 당장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안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자유'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어떤 자세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부터 가르쳐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교육 방안'이 필요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학생들에 의해서 성추행 당하고 성희롱 당하는 여교사의 모습을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 속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어두운 학교 사회의 단면을 해결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자유의식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⑬ 임성현(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동방예의지국, 오래 전부터 세계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더 이상 이 단어를 쓰기 부끄러울 정도로 예의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 월 각종 SNS 를 통해 순천제일고 패륜동영상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그 동영상을 본 모든 국민들이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이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더 이상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릴 수 없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우리 교육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유럽 국가 중 핀란드는 세계 교육 1 위를 달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 중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핀란드는 성적표에 석차가 없다고 합니다. 즉,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핀란드는 오히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재능을 살려주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가르치는 점이 핀란드 교육의 핵심입니다. 대학 진학만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중·고등학교에 비해 핀란드의 학교들은 학생들 개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교육 목적을 갖고 있지요.

또한 핀란드는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안정을 위한 '학생 복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장·보건교사·학교심리상담사·심리치료간호사·특수학급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갖고 학생의 기초 능력과 학업 성취, 그리고 학교생활 참여 등에 대해 점검합니다.



핀란드 학생들의 성적표에는 석차가 없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바람직한 인성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인성교육은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 속에 인성교육이 녹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절대평가 시스템 등을 도입해 핀란드와 비슷하게 경쟁보다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초등학교는 1~2 학년 때 덧셈·뺄셈과 같은 기초만 가르치고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는 등 지나치게 학습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토론이나 역할극 등 체험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생활습관이나 예절 같은 기본적 인성을 가르치는데 집중한다고 하네요.

특히 일부 주에서는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목표를 인성교육에 두도록 주 교육법에 명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하임(Hei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범죄를 저지른 학생 등을 수용해 보살피는 학교폭력 사후 대책입니다.

위기행동의 유형에 따라 8~10 명의 청소년들과 전문치료사·상담가 등 평균 4 명의 전문가가 24 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공동생활을 합니다. 하임에서는 위기 학생들에게 상담과 치료, 범죄예방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건물 청소 등을 통해 인내심과 집중력을 기르고 사회적응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 인성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독일

우리나라 학생 관리 체제에 비해 훨씬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인성교육 대국민 설문·실태조사를 보면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인성 형성에 가장 부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 형성에 부적적인 영향을 끼치는 1 순위 요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9.4%가 '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을 뽑았고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이 20.8%, '폭력적인 또래 문화'가 19.1%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 40.3%가 '있다'고 응답을 했고 그 이유로는 '학업성적' 41.8%, '재미없는 학교 생활' 22.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만 보더라도 우리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가정교육도 문제가 있고 폭력문화를 만들어 낸 사회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교과부는 추상적인 인성 덕목을 구체화하고, 지식 중심에서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학교 교육을 재구조화하는 한편 인성교육의 패러다임을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성교육이 특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따로 과목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과부의 학교 교육 재구조화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친 경쟁으로 얼룩져 있고 승자와 패자를 극단적으로 나누는 사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패자가 되면 낙오된다라는 걱정으로 고통스러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경쟁하던 사회를 협동을 강조하는 사회로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부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더 미래를 보고 교육에 관한 정책들을 세운다면 우리나라, 다시 동방예의지국이라 칭송받지 않을까요?

⑭ 김광래(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제창된 것은 최근 교권의 실종과 더불어 학생들의, 신분을 벗어난 지나친 행동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학벌과 경쟁 사회에서의 지나친 학습 열풍으로 인해 다른 것보다 성적을 강요당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성문제가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가 불시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유명한 제도이며 따라서 교육 제도는 본격적으로 인성교육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일렬로 줄 세워 그저 공부만을 외치던 세상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을 정착시키고 좀 더 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영국의 의과대학 입시에서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면접이다.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는 소위 입학사정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성적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만 받으면 되고, 수험생은 자신이 왜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요청 받는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봉사활동 경력이나 Job Experience 등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픈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방학 때면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생활을 실제로 실천한다. 자신의 사명이 곧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이 모인 공간이기에 당연히 의사들 중 최고의 의사는 외과의이다. 영국의 의사들은 그래서 외과의를 부러워하고 존경한다. 우리나라 의대에서 가장 탑을 차지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물론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스펙 전쟁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요청을 통해 어려서부터 의사의 꿈을 키운다 하더라도, 스스로 실제 봉사활동을 해가며 측은지심을 배우고, 공부까지 잘해야 하며, 오랜 시간 그렇게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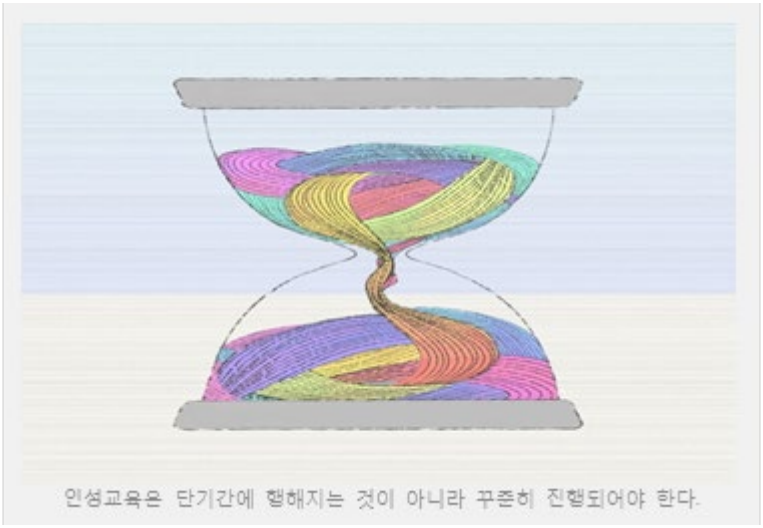
인성 또한 교육에 의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성이라는 것은 그렇기에 어느 정도 교육에 의해 가르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을 높일 수 있고, 돈이나 우리 사회의 가치가 판단하는 순서보다 좀 더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가치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 점은 우리나라와 영국의 의대 입시 차이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인성교육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점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의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투명성의 가치를 알리고 도덕적 관념과 인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이런 인성교육이 탄력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입학사정관에게서도 비리가 발견되었으며, 힘과 돈을 가진 자가 승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없으며 따라서 부는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져가고 있다. 우리는 기회의 평등과 투명성을 위해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고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룡 스타벅스와 네슬레가 무너지고 공정무역을 선택했다. 유럽사람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Fair Trade 제품을 선택하고 있으며, 가난한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착취하여 얻은 제품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인성교육은 단기간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유럽은 비로소 더 발전된 자본주의인 호혜주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코 한 두 해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은 아니다. 결과가 잘 보이지 않기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높은 시민의식과 더 나은 세상을 진정 바란다면 인성교육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⑮ 김민정(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최근 청년들의 취업에서 가장 고민거리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인성평가입니다. 과거의 기업들은 개인의 능력만을 강요하여 스펙과 학벌이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채용 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더 에이치(The H)'라는 이름의 새로운 채용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이 방식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찾기 위해 캐스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1 차 캐스팅에 대상자로 뽑힌 청년들을 3~4 개월 간 등산, 여행,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장기간 동안 인성을 살핀 후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SK 그룹은 올해부터 '바이킹 챌린지' 오디션 채용방식으로 인턴사원을 뽑았습니다. 이 방식은 지원서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졸업년도 4 지와 자기소개서로 서류전형을 뽑은 후, 면접전형은 전국 5 개 도시에서 예선 오디션과, 1 박 2 일의 결선오디션을 진행합니다. SK 그룹은 전체 채용자중 10%가량을 오디션 방식으로 채용하였습니다.

KT 에서는 학력과 배경에 관계없이 능력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올레 스타 오디션'을 진행하였다. 이 방식은 서류기준을 완화해 자기소개서로만 서류과정을 치르고 입상경력이나 지원분야에 대한 조사경험을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KT 는 최종합격자의 10%를 오디션 방식으로 뽑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스펙을 위해 경험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고 한국사회의 획일화된 스펙문화를 바꾸기 위해 인성을 인재 선발의 가정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토익점수와, 학력 등의 스펙 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인성평가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참신한 인재를 위해 기업들은 새로운 채용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과거에는 빨리 따라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은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채용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양한 시도로 청년들의 인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스펙을 묻지 않는 채용을 반기지만, 한 편으로는 새로운 인성평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듭니다. 우리의 교육과정은 획일화된 교육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준비하는 스펙 쌓기는 익숙하지만, 인성평가는 도통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청년들에게는 취업준비 요건이 하나 더 늘어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창의적 인재를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 오지만, 정작 우리의 교육시스템에서는 여전히 인성교육은 부족합니다. 중앙일보와 리처치앤리서치는 30 여개 대학의 3000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내 인성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경험을 묻는 일대일 면접조사를 하였습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의 과반 수 이상이 대학교 내에서 인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인성교육을 더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연세대 4 학년 김모(27)씨는 “인성을 기르기 위해 사회봉사 수업을 듣고 싶어도 정원이 너무 적어 수강 신청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고, 고려대 3 학년 김모(23·여)씨도 “인성 관련 강의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내용이 형식적이어서 매력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카톨릭대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인성교육의 한 방법으로 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의대생 차준용(20·2 학년)씨는 “환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고통을 보듬을 줄 아는 의사가 돼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며, 의술보다 중요한 의사의 자질을 길렀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모든 재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시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는 ‘인간의 길’, 사회적 소통능력을 기르게 합니다.

기업들은 향 후 인성평가를 통한 채용을 더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성평가 준비를 유독 힘들어 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교육과정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교는 사회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리더십 등을 익힐 수 있는 인성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⑯ 김수창(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지난 2011 년 6 월에 서울 지하철 1 호선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나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지하철 막말남' 사건입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된 4 분 남짓의 분량의 영상에서는 한 젊은 20 대 남성이 80 대 할아버지가 자신이 다리 꼬는 행동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말리는 다른 60 대 할아버지에게는 말리지 마라고 신경질을 부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의 끝부분에 이 남성은 '서울역에서 내리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남기고 내립니다.

같은 해 12 월에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줄을 서라고 하는 60 대 할아버지에게 10 대 고등학생들이 욕을 퍼붓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꽤 오래된 사건이지만 아직까지도 알 만한 사람들의 입에는 오르내리는 사건들이지요.

왜 이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접한 학계에서는 '인성교육'의 부재 현상이 심각한 공교육의 현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는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의 전반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는 오로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우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끊임없는 상과 인센티브를,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는 매와 벌을 줍니다.

실제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지만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1 등인 친구와 떠들면 오히려 공부하는 줄 알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밑바닥인 친구와 떠들면 같이 불려 나와 매를 맞곤 했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실제로 좋은 친구를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를 판단할 때, 그 친구의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인격이 별로라도 좋은 친구, 성적이 나쁘면 아무리 그 친구가 성격이 좋고 착하더라도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자녀에게 해로운 친구인 것입니다.

이렇듯 인성교육의 부재와 입시 위주의 성과주의 교육 속에서의 학생들은 결국 선진화된 시민으로 성장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성적 위주의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1 등이라고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특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성적이 아래쪽인 학생에게 시험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사례 설명을 하자면 당시 반 석차 1 등인 친구와 제가 함께 지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담임 선생님의 대우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XX 이는 들어가고 수창이 넌 엎드려!’ 그날 저는 혼자서 몽둥이 다섯 대를 맞아야만 하였습니다. 학교측의 성적 차별은 상위권인 학생과 하위권인 학생에게 둘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위권인 학생에게는 자기는 성격이 어떻듯 ‘난 공부를 잘 하니까 무조건 잘났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하위권인 학생에게는 차별로 인한 박탈감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학생의 성적으로 학교 생활에 있어 차별을 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계발활동 시간 편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무조건 국영수 위주의 수업 방식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부여할 뿐입니다.

계발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담당 선생님과 친구들간의 다양한 지적 교류와 의사소통의 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계발활동은 친구들과의 소통의 장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풍부한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주말만이라도 정말 가족들끼리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한 학생 집단과 그 대조군으로 가족과 거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한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족과의 유대 관계도 학생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정에서의 역할 또한 학교에서 수행하는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는 인격보다는 고스펙을 가진 인재만을 요구하게 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또한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가정과 학교에서 약간의 노력만 한다면 다시 우리는 이전의 인정 넘치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⑰ 김한결(강원대학교 일본학과)



지난 6 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순천 제일고 학생들이 요양원 봉사활동 중 누워계신 할머니에게 반말을 하고, 괴롭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인성문제. 이것은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학부모와 사회적 분위기가 인성교육을 소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겨울 종영한 KBS 드라마 '학교 2013'에서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오해가 생겨 선생님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오해를 풀어주자고 이야기하지만 여학생은 "관심 없는데요. 도와주는 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전 안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 합니다. 공부 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의 목표가 '대학입학'이 되면서 경쟁과 공부가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아닌,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경쟁의 상대로서 친구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인성교육은 지금처럼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제도 아래에서 학생들에게 '인성'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시험에서 지문으로 등장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7 월 모의고사 언어영역 지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수학능력시험 7 월 모의고사 언어영역에 등장한 '노희경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지문을 푼 고 3 학생들은 "시험 보다가 울어보긴 처음이네", "엄마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등의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입시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위의 사례와 같이 아이들이 풀어야 할 문제에 '인성'과 관련된 문제와 지문을 넣는 것입니다. 특히 언어영역 비문학 파트에 인성과 관련된 지문과 문제를 넣는다면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레 인성에 관한 글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인 고전문학의 파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학능력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박씨전'을 읽으면서 '사람은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중요하구나.' 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전을 배우면서 인성을 함께 배웁니다.

학생들의 지능지수는 높아졌지만 인성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입시가 전부인 학생들에게 인성에 관하여 따로 교육을 하고 아이들의 시간을 인성교육에 할애한다면, 분명 그만큼의 가치는 있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의 지문, 즉 이야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감정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협동하는 방법과 어른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 고운말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를 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인성이란 것은 습관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이 바뀔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인성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⑱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요즘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을 만큼 인성교육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인성교육의 부재 문제는 역사교육 부재와 더불어 교육계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교육계 안팎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주요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입학사정관제로, 고입과 대입을 위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이 아닌 자기주도적인 학생을 우대하겠다는 취지로 학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인성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부재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입학사정관제가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 과연 입학사정관제가 인성교육의 문제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을까?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능과 같이 단순히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는 입학사정관제는 큰 메리트를 가진다. 그러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될 자료들이 과연 아이들의 인성도를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

입학사정관제는 아직 많은 찬반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가장 화두가 되는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으로는 입학사정관제가 부정입학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공정성의 문제와 교육양극화 심화로 사교육시장을 더욱 활성화시켜 공교육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역사교육의 문제도 수능필수과목 지정이라는 대안이 뜨겁게 논란되고 있는 가운데, 인성교육의 문제 또한 입학사정관제 안정화라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해결은 과연 입시제도에 반영하는 것 밖에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인천의 작전 초등학교에서는 '바른말 암행어사'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의 작전초등학교에는 바른말 암행어사가 있다. 학기 초부터 매주 2 명의 아이들에게 암행어사로서 마패를 전달하고, 암행어사로 뽑힌 아이들은 한 주 동안 교실에서 주고받는 친구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한 주간 바른말 쓰기를 가장 잘 실천한 어린이를 한 명씩 뽑아 추천함에 넣어 학기말에 최대 추천을 받은 어린이에게는 문화상품권 등이 수여된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격없는 지식과 인간미 없는 학문은 사회적 죄악이라고 하였다.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성이란 지식보다도 앞서 내재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인성도 평가를 입시제도에 반영한다면 인성문제의 뿌리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수박 겉 핥기식 평가가 될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인격이 또 하나의 학문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인성을 입시제도의 평가요소로 전락시켜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워줄 것이 아니라 '바른말 암행어사'와 같이 생활 속에서 인성을 교육시키고 점수제가 아닌 습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인간으로서 마땅히 내재되어야 할 품격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인성문제의 뿌리를 바로 잡는 해답이 될 것이다.

⑲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얼마 전 SBS 에서 방영하는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에 호주 출신 장애인 닉 부이치치가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팔 다리가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그가 장애라는 역경을 극복하며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자 강연가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는데요.

닉 부이치치가 전한 여러 이야기 중 저는 그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배우고 어울리기를 원했던 그의 부모님의 바람에 따라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그의 일반학교에서의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외모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던 그는 어린 나이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에게 '넌 충분히 멋지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주며 그를 괴롭히던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비장애 학생들 사이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며 중·고등학교 학생회장까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와 함께 학창시절을 보낸 많은 일반학생들은 장애인인 그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닉 부이치치 역시 일반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의 행동양식을 배우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닉 부이치치는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는 등의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모든 일을 부모님께 의존한다면 너의 존엄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친구의 조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례를 통해 교육의 발전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교육의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또는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 닉 부이치치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합교육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실제적인 사회활동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고, 일반학습에서 정상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일반아동이 통합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더욱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장애아동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나 오해가 감소하게 되어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장애아동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일반아동에게는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통합교육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인프라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교육을 실천하기에 열악한 환경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동수업을 할 때면 장애학생은 늘 따로 수업을 받거나, 교실에 혼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설적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실천의 미흡과 특히 특수교사의 부족과 처우개선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은 장애학생과 그들 학부모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통합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걸림돌은 장애 학생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닉 부이치치가 우리나라에 살았더라면?'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우리나라에 살았더라면 학부모들의 반대로 일반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것조차 어려웠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사례를 접한 글쓴이가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의 부족을 꼬집은 내용이었습니다.

자녀의 학급에 장애학우가 있을 때 학부모들의 거리낌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 담임교사의 관심이 장애학생에게 쏠리면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줄고 여러가지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막연한 생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장애 자녀를 보며 눈물을 훔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장애아동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와 이해심을 지닌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통합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선행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교사는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이 친구로서 받아들여지고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편안하고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통합교육의 실현을 통해 우리의 학교현장에서 장애 아동과 비 장애아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학습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리면서 모든 아이들이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⑳ 홍용남(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10 대 청소년들이 자살을 결심하고 있다. 단연, 가장 큰 이유는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발생하자, 국가는 대대적인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10 대 학교폭력 문제에 경찰이 관여하기 시작한 것도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교내 폭력써클 형태의 조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대체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데 있다.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내가 가해자라면?"이라는 생각을 안 해본 듯 싶다.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인 "그들은 왜 때리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이 가난해서?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해자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적인 것일 뿐 모든 범죄들이 갖는 공통적인 패턴일 뿐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공부 잘하고 집 잘살고 잘생긴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가정상담을 받게 한다는 전략은 먹혀들 리 없다. 학창시절을 떠올려보자. 어떤 학생이 인성교육을 받으면 도덕군자가 되고, 가정상담을 받으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실제로는 자신을 어른이라 생각하며, 어른들의 인성교육, 상담 등을 '우습다'고 여긴다. 그게 현실임을 직시해야만 한다. 무신론자에게 좋은 성경글귀라며 읽어준다면, 효과가 있을까? 모든 매체에는 매체 수용도가 있다.



이 포스터를 보면 학교폭력에 관심이 가져지는가?

아쉽게도, 학교폭력 가해자뿐 아니라, 대다수의 10 대 학생들에게 담임교사 상담, 인성교육, 도덕교육 등은 아주 낮은 수용도를 갖는 매체다. 특히, 담임교사 상담은 효과가 아주 애매하다. 학창시절을 돌아봤을 때, 훌륭한 선생님도 많았으나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도 있지 않았는가?

10 대 청소년들에게 가장 수용도가 높은 매체는 담임교사 상담도 아니고 인성교육도 아니며, 도덕과목도 아니다.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말을 걸고 싶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용해야 한다. 그들이 귀를 열고 가슴으로 들어줄 때는 '영화, 드라마'를 볼 때다.

영화, 드라마는 10 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 가상의 주인공이 롤 모델이 되며 그들의 언행과 행동을 따라 하기도 한다.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하며 세상을 학습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영화, 드라마'를 통해 세상을 학습하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제시하는 영화, 드라마를 본 아이들. 그들은 왜 때릴까? 정답은 하나다. 잔혹한 살인마처럼 '세상이 미워서'도 아니고 '심심해서'도 아니다. '멋있어서'고, '강해지고 싶어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을 하나 소개한다.

학교는 작은 사회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으며 규율이 있고 조직이 있고,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돈', '명예'를 가진 사람이 이러한 계급의 상위에 오르지만, 아이들은 조금 다르다. 그들의 계급을 나누는 것은 '주먹'과 '조직'이다.

학창시절, 싸움을 잘하면 절대로 하위계급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싸움 잘하는 학생이 학교폭력 당했다는 소리를 들어봤는가? 싸움을 못하는 아이들은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 '조직'에 속해야 한다. 물론, 그 조직에 들어가려면 '주먹'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 즉 살기 위해 약자를 괴롭히고 돈을 뺏는다. 그러한 모습이 '주먹'의 마음에 들면 그 또한 상위 계급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상위계급이 되지 못하면 학교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과 어깨 부딪치지 않도록 노심초사 해야만 한다.

이러한 학교 사회의 '계급'은 매년 더 정교하게 디자인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줄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계급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영화, TV'다. 아이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학습하는 '영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싸움을 잘하고, 인기도 많다.


영화 속에서 폭력과 조직활동은 너무나도 멋지다

영화 '말죽거리잔혹사'가 유행할 때 쯤 수 차례 학교폭력을 목격했다. '잘 나가는' 친구들은 복도에서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X 새끼야"라며 영화 속 명대사를 읊조리며 히히덕 거렸다. 물론, 복도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주먹'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영화는 단연 '히어로물'이다. 배트맨, 슈퍼맨 등 약자를 구하고 범죄자를 무찌르는 모습을 멋지게 묘사해낸다. 그런데, 우리 영화, 드라마를 보면 악역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유난히 학원폭력물, 조폭 영화가 많다.

10 대 청소년들은 멋있어지고 싶다. TV, 영화를 보고 멋있는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학습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매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전혀 잘못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영화, 드라마의 대다수는 폭력을 미화하고 있다. 폭력이 멋있어 보인다면, 그것이 미화다.

반면, 대다수의 영화, 드라마에서 공부 잘하는 모범생은 늘 동그란 뿔테 안경을 쓴 못생기고 공부빼곤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너무나도 커서 흘러내리는 안경을 검지손가락으로 올려주며 바보 같은 매력을 더하는 것은 이제는 공식처럼 돼버렸다.

최근 학교를 주제로 한 드라마를 봤을 때 더욱 절망적이었다. 싸움은 필수공식이며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과 조직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스토리텔링으로 엮여냈다. 10 대들이 열광하는 드라마에서 정말 본보기가 되는 '롤모델'을 형성해준 셈이다.

위에서 강조했듯, 학생들 사이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며 이는 모든 사회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 정교하게 디자인하고 있는 것은 매체다. 폭력과 공포를 멋들어지게 묘사해내는 매체들이 각성해야만 하는 이유다.

매체는 사회상을 반영한다. 하지만, 사회상이 매체를 반영하기도 한다. 즉, 매체가 사회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잘못된 사회상을 고칠 수도 있다. 잘못된 사회상을 멋들어지게 묘사해내는 기존의 흥행공식을 버려야만 한다.

담배 판매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TV 광고, 가격인하? 그 무엇도 아니다. 영화 '대부' 시리즈 에서 알 파치노가 힘든 결정을 내리고 담배 한 모금을 내뱉을 때 경탄이 쏟아진다. "아~ 멋있다" 동의할 수 없는가?


아이들은 '멋짐'을 추구하고 싶을 뿐이다.

금연을 결심한 많은 사람들이 영화 '신세계'를 본 뒤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담배를 너무나도 멋지게 핀다. 물론, 성인이 담배를 피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신세계가 19 세 관람가라고 청소년들이 못 보는 세상인가?

소수의 아이들은 '신세계'를 본 뒤 아주 멋들어지게 담배를 입에 물었을 것이다. 주인공처럼 아주 씁쓸한 표정으로 인상을 지으면서 멋지게 말이다. 이게 현실이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은 있을 수 없다. 본질을 꿰뚫어야만 한다.

그저, 단기적으로 "나 이 정책 만들었어요"식의 전형적인 공무원 식 업무 수행 방법으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현실적으로 매체수용도가 높은 영화, 드라마를 잡아야만 한다. 그곳에 본질이 있으며, 학생들의 가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다.

정말 친구들에게 잔혹하기로 유명한 친구가 학교에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것을 봤다. 수용도가 높은 매체를 보면 그들은 자진해서 휴대폰도 보지 않고 집중한다. 그들의 마음에 접근하여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 할 때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의현(서울경제 3), 이동한(서울경제 3), 이동욱(서울경제 3), 손계준(서울지리 3)

손계준(서울지리 3):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내 교육의 현실은 창의인성 교육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단순히 '시험통과'를 위한 교육을 넘어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인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실효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께서는 인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동욱(서울경제 3): 인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의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능력들 위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하에서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요소이고 그래서 평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등한시되고 인성교육을 위한 노력을 할지라도 단순히 어떠한 평가요소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인성교육 자체가 등한시된 것 같습니다.

이동한(서울경제 3):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인성도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식을 '시험'이라는 것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으로 지식을 모두 파악할 수 없는데도 그나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시제도나 그런 게 있는 것인데, 인성도 평가기준이 분명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기준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의현(서울경제 3): 인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시험 등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평가'하자고 나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 인성이 베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평가보다는 예를 들어 논어, 도덕경과 같은 책을 읽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성에 관한 가치를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즉,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한 내재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성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평가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계준(서울지리 3): 네, 여러분의 말을 정리하자면, 우리 사회가 이전부터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람의 지식을 평가해왔고 시험에 '적합한' 인재만을 키워온 것이 아닌가 싶고 '인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평가기준이 존재하고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면 박의현(서울경제 3) 학우께서는 평가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평가'와 '자연적 습득',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의현(서울경제 3): 점점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맞벌이를 하면서 '교류'의 시간이 적어지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숙한 삶을 보고 배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 방관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관하지 말고 아이들과의 시간을 늘리고 관심과 교류를 늘려서 가끔은 벌을 주는 식으로 강경한 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지만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서울경제 3):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칭찬할 때, 보통 '성적'을 가지고 칭찬을 하곤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어렵지만 성적보다는 어떤 행동을 해서 잘했고,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칭찬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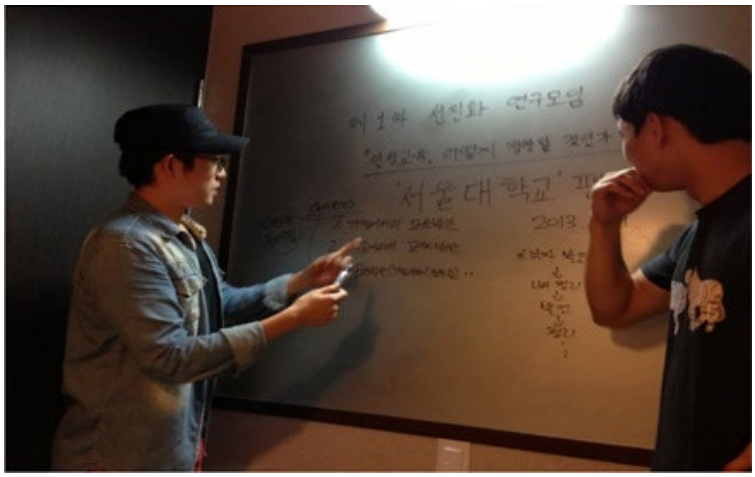
그래서 이를 위해 무조건 저녁을 가족끼리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예절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러한 것을 권장하고 보장해줘야 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사회차원에서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서울경제 3): 우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 기성세대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식자체가 있는데요, 경쟁위주,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발생한 개인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세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와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부모와의 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사실상 가능한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부부들이 자녀에게 시간을 쏟기 싫어서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결과인데요, 그래서 그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모두가 연계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가정에 어느 정도 이양해서 일정 부분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또 학교와 가정, 학교와 기업, 기업과 가정 등 연계해서 휴가제도를 개정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손계준(서울지리 3): 네, 제 생각에도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녀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성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동한(서울경제 3): 제 생각에 '초등학교'는 시험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인성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때부터 중간, 기말고사라는 논리에 찌들어 있으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보다는 '기본 소양'을 만든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아이들이 '게임방'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게임을 하면서 비속어도 배우고 인성이 나빠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나 캠핑 등을 권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의현(서울경제 3): 물론 시행함에 있어 '학생인권'문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우선해서 만약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규제책'을 학교에서 강경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처벌함과 동시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예체능'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팀워크와 협력을 키울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게임을 통해서도 발전시킬 수 있지만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잘 개설해주고, 중고등학교에 까지도 연계되어 잘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서울경제 3): 교권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교권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체벌하거나 강제로 구속을 하는 등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고 아이들을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학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자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인식도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3 자가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재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저는 시험을 없애거나 예체능으로 바꾼다는 말도 좋지만, 이를 통해 인성교육이 되면 좋지만 안될 것 같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수를 늘린다고 해도 그 시간에 아이들을 보면, 공부한다는 애들은 체육시간에 몸 아프다고 자습하고 그러는데요,

지금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얼마나 그런 협동 수업에 잘 참여를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한 다음 분명히 평가항목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개편을 해도 학부모와 학생이 따라주지 않을 것이 자명하므로 그런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계준(서울지리 3):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초등학교에서만큼은 시험제도를 없애고 기본 소양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과, 잘못을 저지르는 학생들에 대해 조금 더 강경한 처벌을 동반한 규제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학교, 학부모, 학생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예체능'과 관련하여 단순히 수업 시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안되고 평가요소에 참여 태도를 분명하게 집어넣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에서 시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박의현(서울경제 3): 우선 학교에서 교화 가능한 수준을 지나면,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강력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인성개선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제도를 벗어나는 것을 제재를 하기로 했으면, 그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휴가'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거나 야근을 강요하는 문화가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근과 회식을 강요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문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아이들이 좋지 않은 장소 등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해야 하는데, 각종 단체에서 나서서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정이나 학교, 여러 단체들에서 조금씩만 관심을 더 기울이고 나선다면 그릇된 인성으로 인해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서울경제 3): 지금 약간은 벗어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아이들이 학교도 잘 다니고 똑똑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항상 자기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협력하는 것도 꺼려하는 그런 형태로 인간상이 발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나중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능력은 뛰어나지만 인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개인적인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인성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발하여 각개각층 전 요소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입부터 시작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와 기업을 보면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상의 붕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전통적인 가치를 되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공동의 책임'으로 생각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하고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휴가제도 개선, 모범적 사례 보이기 등을 통해 솔선하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서울경제 3):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차원으로 생각해보면 '분위기'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돈 잘 벌고 성공한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의 높은 인격을 더 많이 칭송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요소에 넣으면 인성 전문 학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똑 같은 상황만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을 모두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동욱(서울경제 3):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요즘 기업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CSR'이 이슈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인성이나 교육 측면에서는 선진화되어 있지 못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의 '드림클래스'를 보면 그것도 CSR 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더 좋은 방법은 없을지 기업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CSR 도 기업만이 담당하지 말고 지자체와 동시에 연구하고 개발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서울경제 3): 맞습니다. 기업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솔선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에서 먼저 나선다면 사람들의 인식도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 열심히 하는구나', 또는 '저 기업은 본 받을 점이 많은 기업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아질 것인데요, 서슴없이 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부문화가 정착되면 우리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계준(서울지리 3):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인성교육의 문제점부터 사회 각 차원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여러 교육 중에서도 '인성'과 관련된 교육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구모임의 결론은 따라서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상호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관심과 인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네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유예송(외국어교육 1) 이다솜(불어불문 2)
강수림(러어러문 2) 강주(아시아문명 1))

이 효정(불어교육 2) : 안녕하세요? 바쁜 학기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 주어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국선진화포럼의 제 77 차 월례토론회 주제였던 '인성교육, 어떻게 정착 할 것인가?'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들만의 각론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 외고 출신인 점과 각자의 전공어가 모두 다른 인문계열인 만큼 전공하는 국가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비교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부터 이야기 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밥상머리교육'에서부터 인성교육의 시작을 보려고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란,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인성을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세끼 중 적어도 한 끼 정도는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인성교육을 시작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한국의 밥상머리 교육이 절대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는 없겠습니다. 여건에 따른 어려운 점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겐 가족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새로운 유형의 가족들도 많이 생겨남에 따라 밥상머리 교육이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의 시선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인성교육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우리나라의 인성교육 정착에 구체적인 보안을 해 줄 방안들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강주은(아시아문명학과 1):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를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도 인성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들어 '1 인 1 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이들의 인성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한 가족에 아이가 한 명밖에 없자 할아버지 세대부터 시작하여 온 가족의 관심이 한 아이에게만 집중되고 자연스레 아이는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며 크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 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며 자라는 아이에게 올바른 인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예술교육을 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시진핑은 서예교육을 도입하여 서예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수양하고 스스로의 삶과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보며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수입되는 종이 값이 두 배 이상으로 상승 할 정도로 서예교육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서예를 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 출처: 구글이미지)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서예교육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것이 중국고전 읽기 교육입니다. 무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인만큼 중국에는 자국의 역사와 역사적 인물들과 관련한 고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고전들을 읽히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역사적 인물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사속에서 구체적인 멘토를 설정하게 하고 그들의 일화와 담화를 읽으면서 올바른 인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생각 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수림(러어러문학과 2) : 한편, 러시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러시아는 4-5 세부터 아이들의 진로를 정하도록 하는 엘리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주 어렸을 적에 평생 할 직업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어릴 적부터 짜여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전문인력으로 양성 해 냅니다.

그런 교육 시스템 덕분에 러시아 학생들을 주어진 자신의 진로를 따라 차근차근 걸어나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인성교육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어릴적부터 예술 교육을 통해 전인적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길거리 마다 까사라는 보드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까사는 그 주의 모든 연극과 오페라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들의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 것을 일컫는데요, 러시아 학생들을 이 까사에 소개되어 있는 다양한 공연들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죠.

이다솜(불어불문학과 2) :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의 함양은 러시아 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에서 미술관의 예약부터 교통편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여 후원합니다. 프랑스의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아뜰리에와 같은 미술관들을 방문하며 그곳에서 예술감성교육을 받게 됩니다.



(미술교육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아이들 출처: 구글이미지)

몇몇의 고등학교에서는 미술이 입시에 '필요 없는' 과목이라 생각하여 아예 미술 수업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대체하고, 한 해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한 번 방문 할까 하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또 프랑스 정부는 한 학급에 20 명이 채 되지 않는 학생들의 수도 많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아야 교사 한명이 담당하여 최대한 보살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최대한 많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부모 이상의 역할을 하며 돌봐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한 달의 한 번은 교사와 부모의 대화의 날로 지정하여 아이들의 생활태도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이야기를 하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 뿐 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과목은 바로 '철학'입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과 교류하고 토론하게 하는 철학 과목을 어릴적부터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높은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유예송(외국어교육계열 1): 프랑스의 이웃나라인 영국의 경우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국가의 특성상 학교에서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이 때 영국의 학생들은 상황극을 설정하여 함께 해 보면서 다른 문화권의 친구도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학생이 전학을 왔다면 그 친구의 생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중국식으로 그 친구에게 생일 파티를 해 주는 상황극을 연출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나와 조금 다른 사람도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효정(불어교육 2): 영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야 말로 점점 더 다문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엄마가 베트남인이라는 이유로 놀림감이 되는 경우가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데 더 이상은 그러지 않고 다양한 문화권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러 클 수 있도록 지도해야 겠습니다.

이다솜(불어불문학과 2): 독일의 경우는 '인성'이 올바른 것이 아주 큰 무기라고 합니다. 어릴적부터 공부를 잘 하는 학생보다 인성이 올바른 학생이 누구에게나 더 칭찬받고 높이 평가 받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인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깨닫게 합니다.

이효정(불어교육 2): 이렇게 국가 별로 인성교육의 방안은 다양함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청소년 인성교육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얻은 몇가지 팁들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좀 더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정착 되길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동석(연세경영 2): 그럼 지금부터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에선 중학생이 왕따를 비롯한 가혹한 학교폭력에 못 이겨 자살하는 일도 있었고 순천에선 할머니에게 막말을 한 패륜 고등학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자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인성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의 문제는 모든 것을 학교에 떠넘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나요?

김보민(연세경영 2): 저는 학교 안에서의 교육으로 인성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학과 과목처럼 암기과목으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의 예를 찾아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학생들의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위한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학교도 3 시면 모든 일과가 끝나 방과 후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배려심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독일에서는 학생들만의 힘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회계부터 모든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분담해서 역할을 나누고 몇 주 동안 여행을 떠나는 활동이 있는데 이러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지(연세경영 2):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 밖에서의 인성교육보다는 학교 안에서의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중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다른 나라의 예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앞에서 말한 독일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토론 문화의 정착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성교육의 핵심이 남을 잘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 토론식의 수업방식이 가장 잘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교사가 따로 없고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게 한 다음 교사가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억압적인 토론 수업이 아닌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는 훈련이 된다면 요즘 인성교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막말 관련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아 지금 말씀은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형식적인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아예 근본적으로 수업 방식을 인성교육이 가능한 토론 수업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시군요. 또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유진(연세경영 2): 근데 학교 차원에서 여행을 떠나거나 학교 차원에서의 토론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말해보자면 사실 현재 우리 나라의 입시 위주 학교 교육 시스템을 보자면 모든 계획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그 것은 해외사례일 것이고 우리 나라에서 토론 수업을 진행한다면 하는 아이들만 참여할 것이고 점수에 반영이 안 된다면 대부분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그럼 지금 평가방식을 시험이 아닌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을 매기는 식으로 바꾸면 실효성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은지(연세경영 2): 제가 찾아봤는데 '프로젝트 중심 학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대학교에 교양필수 과목으로 있는 수업 중에 교수가 주제만 정해주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학생들이

토론하는 결과물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는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 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다면 토론 수업의 정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규상(연세경영 2): 제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우선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바른 인성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할 때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 등 학교 밖에서 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성교육이 부족한 이유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해결방안은 하나의 프로젝트 같은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 커뮤니티'라고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5 세부터 13 세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모들과 함께 4~5 가구가 모여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별로 각종 스포츠활동이나 캠핑 등 여행활동, 독서활동 등 인간관계를 많이 가짐으로써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활동 중에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개입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주고 아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줘서 집단 따돌림 등 아이들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이 부모님과 친구 부모님을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경심이나 어른을 대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회문제인 부모폭행, 교사폭행 등을 고려해보면 5~13 세의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한다면 이런 사건을 미연의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다양한 아이들이 한 커뮤니티에 속해 있을수록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점점 많아지는 다문화가정들이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을 배척하려는 사고방식이 사라지고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장애요소의 경우 실제로 이런 커뮤니티를 하라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면서까지 진짜 할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내키지는 않지만 입시에 반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위해서 금전적인 요소의 경우 인성교육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국가에서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활동내역을 받아 지원을 해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이나 대중교통, 영화관, 캠핑 등에 있어 활인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처럼 부모님이 시간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최소한 추가업무를 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직장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강유진(연세경영 2):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대상이 전국에 있는 모든 5~13 세의 아이들이다 보니 활동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조금 뜬 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국민의 레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이 아무리 인성교육에 필요성에 대해 실감한다고 해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상이 5~13 세인데 사실 인성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중, 고등학교 때 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안 좋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너무 어렸을 때 하는 것이라 낭비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규상(연세경영 2):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보자면 우선 이름을 활동 커뮤니티라고 정했어도 거창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주말에 아빠와 함께 하는 축구교실, 요즘 방송하는 아빠 어디가? 같이 어려운 것이 아닌 쉬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부분 역시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활인이라던가 그런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라서 국가에 큰 부담을 안 가질 것 같습니다.

또 5~13 세로 대상을 정한 이유는 아이들이 중,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 탈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인성교육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간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 친구들간의 관계를 맺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5~13 세로 정했습니다.

조은지(연세경영 2):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면 그 것은 활동 커뮤니티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친한 집들끼리 모여서 신청을 해서 이 활동이 인성교육이 아닌 단순한 친목도모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서로 일단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상(연세경영 2): 아까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가정이 섞여 있을수록 인성교육의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 아이와 농촌 아이, 해외에서 살다 온 아이 이렇게 합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을 이해하는 방법을 교과서가 아닌 현장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만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인성교육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기동(연세경영 2): 저는 제도적인 부분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의식에 초점을 두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성교육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자체가 과거 대가족 중심에서 가능했던 인성교육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체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정에서는 당장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겠다는 인식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 아이들과의 대화를 꺼려하시거나 거북스러워 하시는 부모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성교육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만큼 부모님과의 대화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 가족들끼리 언제 만날 수 있느냐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추석, 설날 때 조차도 여러 핑계로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족과 사회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나 덧붙이자면 수업 시간 전에 짧게 고전을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전에는 옛 가치관, 교훈 등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제 고등학교 때 경험을 비추어 말씀 드리자면 아이들 인성교육에 있어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활동을 아이들에게 추천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정리해보자면 우선 부모님들은 자식과의 대화시간을 늘리고 친척들과 자식간의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외부에서는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김기동 학우가 말씀해주신 이 부분 중에서, 특히 앞에서 말한 부모님, 즉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유진(연세경영 2): 지금까지 이규상, 김기동 학우께서 말씀하신 부분 모두 인성교육에서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인성교육과 관련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을 비롯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을 인성교육에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으로 발전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지(연세경영 2): 인성교육이 학교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제가 학교 외부가 아닌 학교 내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이 것을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더해서 생각해본 것이 학교의 성적 평가 시스템 자체에서 인성교육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 성적 평가 시스템에 인성교육이 많이 묻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오래 지속된다면 그 것이 사회 전체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시간의 경우도 사실 지금도 학교에서 봉사시간이 존재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고 인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제 문에서도 나온 입학사정관 관련해서도 사실 학생의 인성이 반영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열띤 토론 참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중에 중복되고 겹치는 것도 있는 데 이제 다른 모든 것은 배제하고 오로지 가정의 역할에만 집중을 해서 이야기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연세경영 2): 제 경험을 이야기해보면 어렸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부모님과 여행을 간 기억이 있고 또 방학마다 한달 동안 친가인 부산에 내려가 조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이 확실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족,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일단 가족들끼리 뭉칠 수 있는,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을 가족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민(연세경영 2): 제가 본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는데 그런 아이일수록 쉽게 짜증을 내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때 야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저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자주 타다 보니 그런 광경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초등학생들이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서 뚫어지게 자신의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이규상(연세경영 2): 저는 가정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럴만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부모님이 모두 바쁘셔서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부모님 젊은 시절 이야기 같은 것을 처음 들으면서 정말 대화를 많이 안 했었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게 부모님이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이번 토론을 계기로 각자의 과거에 대해서도 한번씩 돌아볼 수 있어 더더욱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해보자면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것이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먼저 그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규상(연세경영 2): 아까 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야기도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면 그런 것들에 집착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시간을 못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더 집착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와 같은 스마트폰, 인터넷에 둘러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진(연세경영 2): 제가 이번에 충동과 자기관리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거기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 위이고, 청소년 자살의 이유 중 40%로 가장 많은 것이 주로 부모님과의 가정 불화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가지 않으려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불화의 빈도도 줄고, 다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강도가 약해질 것 같습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그러면 이제 가정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 그 중에서도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멘토, 또 그 중에서도 이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지금 멘토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인가 입니다.

김기동(연세경영 2): 제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해보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멘토 자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꼭 공부적인 부분이 아닌 생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멘토가 일단 가르치는 아이에 한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전수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아이가 나중에 단체생활이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정리해보자면 지금 김기동 학우께서는 멘토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주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 생각엔 멘토를 정할 때 방금 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불어넣어줄 수 있냐라는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은지(연세경영 2): 저는 개인적으로 멘토의 경우 자신이 자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경우 모르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자질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멘토를 선정하고 나서 한 달에 한번 이라던가 일정 기간을 주기로 멘토들끼리 모여 재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나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활동비를 준다던가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멘토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멘토 시스템이었다면 제가 생각해본 것은 사회 명사와의 멘토 시스템입니다. 사회 명사들과 중, 고등학생 그룹과 매칭을 시켜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시켜준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은지(연세경영 2):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드림 멘토링이라고 존재합니다. 거기 등록되어있는 명사들을 신청하면 몇 개월 동안 그 분들과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강유진(연세경영 2): 저는 또 다른 생각인데요. 예전에 보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나 문화유적을 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너무 걸 그룹, 한류 K-POP, 이런 것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방송 쪽에서도 예능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많이 보는 만큼 인성교육을 예능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규상(연세경영 2): 이게 실제로 인성교육에 효과가 있을 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사회 인사와의 멘토링 같은 경우 실제로 사회 명사와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겠지만 인성교육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조은지(연세경영 2): 저도 그래서 멘토링 시스템에서 인성교육이 가능 하려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회명사 멘토링 같은 경우 멘토들의 이야기를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사회 명사지만 그래도 같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럼 사회 명사와의 멘토링 시스템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인성교육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인성교육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모르던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인성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 위부터 이어진(교육학과 2), 김지아(교육학과 3)
아래쪽 위부터 이지선, 박노원, 장서현(교육학과 2)

송현지(이대교육 2): 먼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미리 메일로 초청장과 토론문을 보내드렸듯이 지난 7 월, 인성교육에 대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의 '인성교육' 이라는 주제를 저의 현실인 사범대 학생들의 현실에 적용하여 '교사, 인성교육 전문가 되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통해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먼저 요즘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잇는 것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입시와 경쟁위주의 사회풍토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저는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부재 역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지아(이대교육 3): 이번에 새로 도입된 예비 교원들의 인성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적성검사가 객관식이잖아요. 인적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론이 아니고 실천적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완벽한 인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객관식 평가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왼쪽부터 김지아(교육학과 3), 이어진(교육학과 2)

송현지(이대교육 2): 네, 저 역시 같은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교사들의 인성을 어떻게 함양시킬 것인가에 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래에 교사를 꿈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고 교사로서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 앞에서 모범이 될 만한 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부족합니다.

저를 비롯한 토론참여자 여러분들의 현실과 맞닿아있는 예비 교원들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사범대에서 가르침과 배움에 관한 여러 교육은 받는데 인성에 관한 교육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는 사범대 커리큘럼에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하나 필수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서현(이대교육 2): 인성교육 자체가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목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도덕이라는 교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 커리큘럼에서 과목 하나 개설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 인성교육을 과목으로 개설한다 해도 교직 인적성검사가 현재 0 학점으로 Pass or Fail 로 평가되듯이 그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인성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평가가 어려운, 동시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기 때문에 그레이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그레이딩 되는 수업으로 개설된다면, 인성과목에서 C 학점을 받게 되었을 때, '이 교사는 인성이 부족하다' 라는 낙인이 찍히지나 않을지 우려됩니다. 인성은 그렇게 등급이 매겨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요.

송현지(이대교육 2): 그렇다면 교과목이 아니라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는 어떨까요?

이지선(이대교육 2): 저는 인성교육이 프로그램화 되어서 보여주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은 눈에 보이는 소양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화보다는, 오히려 사범대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 교직과목마다 교수님들께서 인성교육과 관련되어 중간중간에 하시는 말씀들을 체계화시켜서 학생들의 교육철학 중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 들게끔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은 한 학기의 수업이나 한 번의 프로그램 이수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범대학에서 미래의 교원이 되기 위해 배우고 준비하는 4 년 동안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연스레 돕는 부분들이 자신의 교육관으로 쌓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서현(이대교육 2): 반드시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주입시켜야 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증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인데요, 그럼 과목으로 만들지 말고 졸업 전에 언제든 제출해도 좋으니까 자신이 인성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한 것을 글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을 가지고 학과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이어진(이대교육 2): 저 역시 인성교육이 과목으로 개설되어 학점이 매겨지는 순간, 학점을 위한 공부와 배움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우리 학교의 채플수업처럼 30 분이라도 좋으니까 매 학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과정을 대학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선(이대교육 2): 또한 그런 과정이 생긴다면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 교사 정도 되면 토론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인성교육에 관해 논의해보고 생각해 볼 테니 한 학기 두 학기 자신의 인성에 대한 성찰과 인성교육에 대한 철학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현지(이대교육 2): 네, 굳이 과목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성교육과 관련된 과정이 개설되어서 예비 교원인 사범대 학생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비교원이나 교사들이 매번 요즘 학생들의 인성만 성토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칠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쯤 되돌아보고 인성교육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아(이대교육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생실습을 좀 더 인성교육과 관련된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범대 학생들은 교생실습을 한 달만 나가잖아요. 한 달이 아니고 졸업 후 임용고시 보기 전에 무조건 1 년이나 6 개월 정도를 인턴처럼 경험보고서를 쓰는 방식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비 교사의 됨됨이와 인성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며 학생들의 인성과 교생들의 인성이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 상황들을 겪어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평가한다거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서현(이대교육 2): 실제로 미국 상담교사의 교생은 한국과는 달리 교육봉사 하듯이 자신의 공강 시간에 일주일에 세네번 한두시간 씩 실제 학교에 가서 교생을 1 년 정도 길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교생처럼 한달 동안 모교에 나가서 추억 만들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교생 실습을 해보는 거죠. 확실히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이지선(이대교육 2): 우리나라에서 현재 행정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왼쪽부터 이지선, 박노원, 장서현(교육학과 2)

송현지(이대교육 2): 다음으로는 현직교사의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는 교사 연수에 인성관련 연수를 포함시키는 방식을 생각해봤어요.

장서현(이대교육 2): 현직 교사의 연수는 적극적 참여율이 낮은 편이에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있는데, 연수가 학점을 주잖아요. 따라서 승진이나 직책 유지 등을 위해서 명목적으로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어진(이대교육 2): 연수를 통해 교사 인성교육을 실시하려면 현재 이루어지는 연수의 내용이 확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고 좀 더 흥미롭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김지아(이대교육 3): 지난 학기 수업시간에 보았던 '우리선생님이 달라졌어요'라는 영상에서 교사 연수의 권위자 세 분이 교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를 연수에 데려가서 사람들 자체의 쌓여있는 분노, 원한, 힘든 것들을 치유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 선생님을 교사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의 사람으로 보고 심리를 치료해주는 것부터 교사들이 가진 어려움들을 해결해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교사 역시 사람이니까 인성이 좋아진다는 것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까지 더하자면 이런 방식의 연수도 교사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서현(이대교육 2): 최근 교장 성추행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교사에게 반드시필요한 자질 중 하나인 인성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이런 교장에게 몇 주 출근 정지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범죄에 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더욱 엄격한 인격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인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교사의 인성관련 범죄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원(이대교육 2): 교사의 인성은 보통사람의 인성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 현장의 리더로서 많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니까 너무 감성적이기보다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나 인성이 좋지 않다고 좋은 교사가 아닌 것도 아니고, 무결점의 사람만이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사가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극복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송현지(교육학과 2), 김지아(교육학과 3), 이어진, 이지선, 박노원(교육학과 2)

송현지(이대교육 2): 사범대 학생으로서, 미래의 교육자로서 인성교육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혹은 기타 제안을 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사로서 가져야 할 인성교육에 대한 태도나 지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과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인성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교사의 인성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앞으로는 교과적인 지식을 배우더라도 인성과 연관지어서 고민해보는 과정들을 통해, 교사인 나도 행복하고 학생도 행복할 수 잇는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지선(이대교육 2): 저는 제 꿈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아 내가 이 수업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구나라고 느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꿈이에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도록 내가 모범이 될 것인가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인성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것 역시 행복한 교실을 위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오늘 토론을 통해 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해보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고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아(이대교육 3): 선생님을 가리켜 매일마다 상처 받는 직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미 사회와 아이들은 많이 병들어있는 상태이고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고 가정과 사회도 힘을 모아 함께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이 아이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성교육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처음에는 인성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했을 텐데, 교육(敎育)이 지식을 가르치고(敎) 기른다(育)는 뜻이라서 지식도 가르치고 사람이 되도록 어르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존재했었는데,

현대의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쪽으로만 너무 기울어져서 '육'이라는 기르는 부분이 너무 생활지도나 규제로만 가버리는 등 '기르다'의 진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박노원(이대교육 2): 저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부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가정에 있는데, 처방은 학교교육으로만 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서현(이대교육 2): 인성교육을 사범대생이나 현직교사에게 시키기 전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체벌이든 훈계든 그것 역시 인성교육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인성교육에 관한 교사들의 처벌이나 훈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방패삼아 학생들이 교사에 대항해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반항을 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을 시키기 전에 인성교육을 가로막는 현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원(이대교육 2): 인적성검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셨듯이, 인성교사전문가자격증 역시 단순히 암기를 통해 자격증 획득에만 치우치게 되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성교육은 시험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송현지(이대교육 2):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사회적 롤모델이 부모님과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매 수업시간마다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처벌하는데 있어서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체벌을 한다던가 하는 모습들만을 보여준다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른 중 하나인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범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번 연구모임을 진행해보았는데요,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 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④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공현덕, 서영채, 박제진, 박무성.
(모두 경영)

김영재(삼육경영 2):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 월 사회봉사를 받고 있던 고등학생의 폐륜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인성교육의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SNS 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유명축구선수의 사건도 인성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성교육과 예체능 과목은 찬밥신세인 현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감사운동이라는 캠페인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초점이 입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정착하기 위해선 입시가 아닌 인성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시스템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시간을 할당해야 하는 인성교육보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감사운동이 딱 그 조건에 맞았습니다.

감사운동이란 하루 5 가지 감사한 일을 노트에 적는 것인데, 사소하고 익숙한 일상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감사운동을 시작한 포항에서 대표적으로 포스코와 해병대 1 사단에서 큰 효과를 거두었고 현재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운동이란 것이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수험생들의 인격을 조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무성(삼육경영 2): 제가 해병대출신이라서 그 운동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감사운동을 접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자율성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감사운동을 하도록 사단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장병들이 감사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과 스트레스를 받았었지만, 감사운동에 대한 설문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웠는데 그 때문에 군에서의 감사운동이 성공적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군대와 달리 감사운동에 대해 자율성이 뒷받침 되어 진행된다면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왼쪽부터 공현덕, 서영채.
(모두 경영)

공현덕(삼육경영 2): 저도 저 말에 공감합니다. 저는 육군이지만 저희 부대에서도 감사운동을 했었는데 과업 이후 쉬는 시간이나 체육활동 시간에 저렇게 감사운동을 하려고 하니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반대로 그런 통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네, 여러분들의 말을 정리하자면, 감사운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환경과 분위기를 기본전제로 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강제적인 분위기에서라면 되려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는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인성교육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제진(삼육경영 2): 저는 저희 삼육대학교의 인성교육시스템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는 학교지만 오히려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대부분 인성에 관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더라도 기독교 교리를 듣는 것 만으로도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왼쪽부터 박제진, 박무성.
(모두 경영)

서영채(삼육경영 2): 제 생각에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너무 강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릴적부터 기독교를 믿어왔던 학생들이 아니고 대학에 와서 처음 접한 학생들일 경우에는 학교의 종교라는 이유로 기독교수업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대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현덕(삼육경영 2): 학교의 슬로건이 사람을 바꾸는 대학이고 인성교육 부문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을 했지만 학교측의 강압적인 종교적 색채는 저도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기독교를 믿어 온 학생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학생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영채씨는 어떤 교육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영채(삼육경영 2): 제 생각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너무 예뻐하고 봐주며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런 육아방식으로 인해 아이들이 버릇없게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을 혼낸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혼날 행동을 했다면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무성(삼육경영 2): 제가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도 않았고 오래 살아본 것도 아니지만 저희 어렸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부모님들은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느낌이 드는 건 공감합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네 저도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학교든 어디서든 부수적인 인성교육이 가능하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공현덕 학생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생각해봤던 교육방법이 있으신가요?



왼쪽부터 공현덕, 서영채, 박제진, 박무성.
(모두 경영)

공현덕(삼육경영 2): 저는 제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현재 인성교육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된 게 옛날에는 약간 베이비붐시대라고 해서 출산율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보통 한명 아니면 두명만 출산하는 저출산시대입니다. 그래서 적게 낳다보니까 예전보다 애기들 한명, 한명을 더 애지중지 하며 키우게 되면서 인성교육이 발달이 안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적당한 인성교육 방법은 생각나진 않지만 인성교육의 해결방안으로 저출산시대의 탈출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재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출산장려정책을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개발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채(삼육경영 2): 저도 저출산이 인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출산은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박무성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무성(삼육경영 2): 네, 저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취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로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정확히는 취직에 들어가는 점수인지 학교 내신에 들어가는 점수인진 모르지만 봉사활동이 점수화되어진 것이 생긴지 10 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봉사활동을 안해서 억지로라도 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처음엔 매우 반대가 심했지만 10 년도 안된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봉사활동으로까지 확대되어 국가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처럼 인성교육도 강제든 자율이든 취직이나 대입에 반영되는 요소로 점수화한다면 학생들이 좀 더 인성적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박제진(삼육경영 2):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서 정형화돼버려서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이 아니라 취직을 위한 인성교육이 되버리지 않을까요? 지금의 봉사활동처럼요.

공현덕(삼육경영 2): 그런데 사람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행동을 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무성 학생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네 여러분 모두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오늘 인성교육정착을 위한 방법으로서 감사운동, 종교의 기본교리를 통한 교육, 부모의 올바른 가정교육, 저출산 문제 해결, 인성교육의 점수반영의 다섯 가지 의견이 나왔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봤는데, 저 말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공현덕, 서영채, 박제진, 김영재.
(모두 경영)

⑤ 인천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우갑(인천정치외교 3): 우선 바쁘신 와중에 그리고 추석 연휴 전날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성교육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먼저 제가 발제를 한 다음, 제 발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발제문을 읽고 나면 김호중 학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 발제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신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하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보셨겠지만 제 발제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정, 특히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통계청의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2 가구 중 1 가구가 맞벌이 가정이다.

맞벌이 가정과 같이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계층에서는 인성이 올바르지 않을 아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성이 올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단순히 관심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양육법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교육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인성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성 교육 학원과 과외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 등 가정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부모들의 올바른 양육 방식의 함양입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닌 적절하고 올바른 관심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일례로 SBS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면 아이의 인성 문제는 아이가 원인이라기 보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아이도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정부나 사회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고, 올바른 양육 방식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중에는 양육 방식과 관련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회사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의 비율입니다. 2012 년 6 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즉, 두 가정 중 한 가정이 맞벌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 회사에 양육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은 이상 올바른 양육법에 관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 중 한 쪽이 아이의 양육에 많은 관심을 쏟는 가정보다 맞벌이 가정 내에서 인성이 올바르지 않은 아이들이 나올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맞벌이 가정을 포함할 수 있는 정부나 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패널들의 생각과 이것에 동의한다면 어떤 지원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그리고 반대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중 학우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중(인천정치외교 2): 저도 인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동감합니다. 범죄에 관한 뉴스를 보면 대개 범죄자들의 가정 환경이 불우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먼저 바로 서야 다른 데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맞벌이 가정이 많은데 이들이 맞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성 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취학 전에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 휴가의 확대라던가 양육원의 무상 지원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요. 아이들은 부모가 아니라 남남인 선생님이라던가 다른 웃어른에게는 함부로 하고,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1 년만 지나면 안 볼 사이, 3 년만 지나면 안 볼 사이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는 대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경제권이나 주거권 등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인천경영 1): 저는 가정의 인성 교육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맞벌이의 영향도 있지만 가정에서 수준 높은 인성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인성교육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만 가졌을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전문성 있는 양육 시설과 프로그램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 등록비가 고액인 만큼 전문성이 높지만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수준이나 시설들이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육 교사 자격증의 자격 요건을 좀 더 강화시키고,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포섭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가정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인천중어중국 3): 저는 가정 내에서의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 아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친구도 아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해서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 들고, 오히려 부모보다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처럼 당장은 노후를 준비해야 할 분들에게 큰 짐을 지게 하는 편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출산 휴가가 있지만 아버지들은 출산 휴가를 가지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는 확실히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지구(인천산업경영 4): 저도 발제문과 같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도 모두가 공유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 한가지 중요한 부분이 유치원과 같은 시설 속의 교사들의 질을 높여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들에 올바른 교육법을 알려줘서 가정 교육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인성 교육이 갈수록 학교나 유치원,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 등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성 교육이 중요시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성 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근본적 원인을 사회적으로 경쟁을 조장하고, 강조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크게 나아가자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공부를 못하면 삶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풍토가 생기고, 더 이상 인성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적으로 공부가 입신양명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공부가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그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핀란드의 모범 교육 사례를 우리한테 도입할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연(인천정치외교 3): 저 같은 경우 이 같은 문제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현재 존재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해결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맞벌이 부부에 관한 사회적 지원책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어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부모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고, 교육관을 가져야 하고 그런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 위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부모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 관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책으로 생각해 본 것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부모로서 어떻게 역할해야 할 것인가 보다는 아동이 0 세에서 7 세까지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고, 각 과정에서 부모는 어떤 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실제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터무니 없이 애가 떼를 쓴다거나 어디가 아프다던가 하는 여러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주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와 같이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는 구체적인 방안과 지식을 습득하는 측면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자녀 양육 때문에 맞벌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면 제 생각에 가장 바람직한 게 직장 내 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논문들을 조금 봤는데 그런데 보면 실제 설문조사에서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그렇지 않은 사설 기관에 보내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데, 맞벌이 부부가 맞벌이를 왜 하겠습니까?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런 데는 보낼 수 없고, 다른 곳에 보내자니 못 미덥고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보육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직장 내 보육 시설을 확충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봤을 때는 당장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기업측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충이 되고,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한다면 결국에는 기업에도 이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지훈(인천정치외교 4): 전부 다 인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잘 되려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피력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인성 교육 과연 중요한 것인가? 꼭 국가가 주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인성 교육을 국가가 많이 주도를 했죠. 군부 독재 시절이라든지 과거에 대학에는 국민윤리학과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국가가 원하는 인재상을 주입하려는 학과인데 국가에서 인성 교육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가정이 실시하는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끔찍이 위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이 강화되면 과잉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식만 좋고, 요즘 학부모들 보면 굉장히 드세잖아요.

왜 우리 자식만 뭘 못하게 하냐 이렇게 학교에 많이 따지는데 이게 더 심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들이 독립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성 교육이 중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처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시켜서 성인이 되면 떳떳한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갑(인천정치외교 3): 지금까지 여섯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김호중 학우께서는 취학 전에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이를 위해서는 출산 휴가의 확대라던가 양육원의 무상 지원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경제권이나 주거권 등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진 학우께서는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과 같은 시설의 질을 높임으로써 인성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김민수 학우께서는 현재 가정 내에서 인성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부모들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출산 휴가와 같은 제도들이 관리, 감독되지 않아 존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제도들의 개선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장지구 학우께서는 물론 가정 내에서의 인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치열한 경쟁 체제로 인해 인성 교육이 뒷전인 것에 있으므로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만연 학우께서는 2 가지의 측면에서 접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측면은 자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모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의 양육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황에 따른 양육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어떤 것이 올바른 양육 법인지에 대해 가르치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맞벌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업 내에 보육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직원들에게도 좋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측면에서도 좋다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조지훈 학우께서는 인성 교육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인성 교육을 국가가 주도할 경우 국가가 원하는 인재상으로 크게 될 텐데 그것은 올바른 인성을 가지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인성 교육을 할 경우 오히려 과잉 보호가 일어나 독립심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인성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기 보다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사회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정신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아이에게도 사회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김호중 학우, 김민수 학우, 이만연 학우는 가정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찬성을 해주셨고, 김영진 학우, 장지구 학우, 조지훈 학우께서는 가정에서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조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정에서 인성 교육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정부나 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지훈(인천정치외교 4):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정을 봤을 때,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처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급격한 복지의 증대는 올바르지 않지만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갑(인천정치외교 3): 조지훈 학우께서는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 말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지훈 학우를 비롯한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장지구(인천산업경영 4): 최근에 되게 화제 되었던 것이 숲 유치원인데요. 어린아이들을 숲에서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 되는 곳이 있어서 TV 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의 인성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큰 효과가 있었고, 부모들의 만족도 또한 엄청 높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한가지 시사하는 점은 이미 해외에서는 이렇게 숲을 체험하게 해주는 활동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늦게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치 단체, 주민 센터 이런 게 잘 보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치 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저는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인성이 올바르지 못한 아이들이 생겨나는 데에는 이런 폐쇄적인 가정 환경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비용을 부담한다면 국가에서도 인성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모와의 접점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아이를 데려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야 하니까 이제 그러한 접점에서 교육적인 측면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가 부모나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죠.

부모가 단순히 아이만 숲 유치원에 보내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을 교사가 체크해서 부모에게 아이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가정에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계속 피드백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자리 잡으면 가정에서도 부모는 전문가를 통해 습득한 지식으로 교육할 수 있고, 또한 공동체가 많이 사라지고, 지역 사회가 약해지는 문제도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교류하게 되면 지역 사회에도 공동체 의식이 견고하게 되는 많은 이점이 있는 지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우갑(인천정치외교 3):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지구 학우께서는 숲에서 체험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인성뿐만 아니라 감수성 등 여러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숲 유치원 프로그램을 방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숲 유치원 프로그램이 부모와 교사가 만나 올바른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된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약해지는 공동체 의식을 다시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인천정치외교 4): 저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까 전에 전반적인 소득이나 복지를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또 해야 되는 것이 입시 교육 구조를 타파해야 인성 교육 문제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숲 유치원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그런 곳에 얼마나 보내겠습니까? 입시 교육이 훨씬 중요한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고, 국제 중학교 보내려고 하고, 중학교 때는 특목고 가려고 하고, 고등학교 때는 명문대 가려고 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입시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데 결국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에서 인성 교육에 신경 쓸 여유가 있는가 학부모들이? 이것은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입시 교육에 얽매여 있으니까 운동도 못하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입시 교육 위주의 구조를 없애야 인성 교육도 실마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우갑(인천정치외교 3): 조지훈 학우께서는 입시 교육 위주의 구조를 타파해야 인성 교육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민수(인천중어중국 3): 인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부모의 인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모두가 다 좋은 부모는 아니니까 부모의 인성이 좋지 않다면 아이에게도 되물림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부모에 대한 인성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이만 가르친다고 이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것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한 가정씩 일일이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가 가족 단위로 활동했는데 요즘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많이 못 보내고 있는데 저는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훈 같은 것이라든지 가정 내에서 생각하는 인성에 대한 기준을 잡고, 인성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시 교육 타파 같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가정에서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인성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에 대한 인성 교육이나 가훈 정하기 이런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갑(인천정치외교 3):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중요하다는 김민수 학우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지훈(인천정치외교 4):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처럼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큰 가정에 필요한 것은 곧 시간적, 경제적 여유죠. 따라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야기 되고 있는 것처럼 노동 시간을 많이 단축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 다 야근하잖아요. 공무원도 야근을 하는 세상인데 노동 시간 단축이 어떻게 보면 인성 교육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노동 시간 단축 말고도 휴일이 너무 없어요. 매일 일하느라 바쁘고 휴가도 못 내는 상황인데 휴가 좀 많이 가게 하는 사회가 필요한 것이죠. 기업, 국가에서도 휴가를 많이 주고, 대통령도 휴가를 안 쓰는 나라인데 어떻게 소시민들이 손 쉽게 휴가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휴가 많이 보장해주고 일적게 시켜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인천경영 1): 계속해서 돈과 시간이 확보되면 인성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인성 교육이 잘 될 거라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조지훈(인천정치외교 4): 경향성의 문제이죠. 물론 충분한 돈과 시간이 100% 올바른 인성으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럴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김영진(인천경영 1): 저소득층의 경우 보통 자녀들을 대학까지 못 보내잖아요. 지금 대학생들을 보면 인성 교육이 다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지훈(인천정치외교 4): 어떤 면에서요?

김영진(인천경영 1):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담배 꽁초를 버린다던가

조지훈(인천정치외교 4): 그것은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하지 않나요?

김영진(인천경영 1):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이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제 생각에는 인성 교육의 관건은 부모의 인성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생각해요. 돈과 시간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겠지만 사랑이 곧 올바른 인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수 학우께서 부모님의 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 인성 교육의 대상은 30 대 이상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30 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부모 인성 교육을 한다고 해서 본성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우갑(인천정치외교 3):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보신적 있나요? 거기에서도 전문가가 부모에게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을 알려주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게 하는데요. 그것처럼 부모의 인성은 못 바꾸지만 부모의 양육법은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그것이 선행된다면 자녀의 인성도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수(인천중어중국 3):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혹시 아버지 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식으로 아버지 학교에서 꼭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30 년 이상 살게 되면 버릇이나 습관 이런걸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도 교육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성인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없는 흰 종이의 상태잖아요. 부모가 하는 대로 다 따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빠서 인성 교육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회사 차원에서 전문가가 부모에게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 지 길게 할 필요도 없고 30 분 정도만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나도 30 년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는 부모님은 없잖아요. 대부분 저희의 부모님은 저희가 올바르게 자라고 성공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연(인천정치외교 3):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도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저 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부모 교육을 예를 들면 나중에 너희가 엄마, 아빠처럼 부모가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시켜서 체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교육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고도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인성 교육 문제가 자주 거론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결국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우갑(인천정치외교 3):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에도 바른 생활이나 슬기로운 생활과 같은 수업에서 좋은 부모에 대한 교육은 받았었잖아요. 하지만 그게 너무 추상적이었잖아요. 아이를 때리지 않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하는 것처럼 매우 추상적이었는데.

이만연 학우가 말씀하셨듯이 부모 교육을 시키되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성 교육이 중요한데 그것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논의해보았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숲 유치원을 통해 아이의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 법을 제공해주는 것, 노동 시간 단축과 휴가를 늘림으로써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아버지 학교와 같이 아이 뿐만 아니라 부모도 인성 교육을 받는 것,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부모 교육을 받게 하는 것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초반에 조지훈 학우가 인성 교육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 토론해보고 토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인천정치외교 4): 제가 왜 이런 의문을 제기했냐 하면 인성 교육을 게을리하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호중(인천정치외교 3):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예절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안 좋은 인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훈(인천정치외교 4): 그렇다면 예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호중(인천정치외교 2): 예절이란 게 인간을 대할 때 얼마나 배려를 잘 하고 이것을 악화시키지 않고, 좋게 발전시키는 그런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훈(인천정치외교 4): 저는 그런 것을 교육하려면 인성교육보다는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의 원리, 법치주의 이런걸 더 교육해야 한다고 봐요. 인성교육 문제는 아이가 민주주의의 원리만 잘 숙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아이가 동성애에 빠지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 한다.

이렇게 부모와 전문가가 계도를 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어려서부터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 교육도 하고, 법치주의를 교육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 과목에서 일부 배우기는 할지는 몰라도 그런 거를 교육시키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인성 교육 이게 유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유교 식의 인성 교육보다는 서구식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교육이 사회의 진보에도 더 알맞고,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의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김영진(인천경영 1): 지금 계속 하고 계신 이야기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교육인데 저는 이거 두 개 자체가 인성 교육 안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웃어른을 공경해라 이런 것이 있는데 당장 서구식의 그런 교육을 가져다 쓰게 되면 우리나라의 특성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대주의의 일환일 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인천정치외교 4): 저도 인성 교육 안에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도하게 권위주의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웃어른을 공경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과도한 권위주의의 일환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그래도 아이들을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이들도 존중의 대상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 문화 때문에 권위주의에 입각한 인성 교육을 많이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영진(인천경영 1): 아이들을 무시하는 어른들은 인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웃어른이라고 아이를 무시할 권리는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인성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예전에 인성 교육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성 교육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인천중어중국 3): 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성이 좋고 나쁘다의 기준이 솔직히 애매모호 하잖아요. 길바닥에 몇 번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개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성 교육이 중요하기는 한데 아까 조지훈 학우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들이 나와 다르다고,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저희들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갑(인천정치외교 3): 국가가 인성 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토론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권위주의적 인성 교육을 국가가 주도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인성 교육을 주도하기보다는 인성 교육이 잘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첫 걸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교육을 통해 나와 남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 할 것인가와 국가가 인성 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토론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토론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대 학생들이 바라 본 인성 교육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⑥ 상명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재혁(상명국통 3): 바쁜 와중에 이렇게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준 두 학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연구모임인 만큼, 앞으로의 토론 진행과 관련하여 함께 방향을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첫 연구모임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인성교육,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최근들어 우리 아이들의 인성 실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집안의 가장이 길가에 침을 뱉는 청소년들을 보고 나무라다가 어린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도 일어났었는데요. 저는 최근 일련의 이러한 사태를 보고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많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 위주의 교육이 중시되다 보니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선 덜 신경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아이들이 점점 배려심 없는 모습과 자기 절제력(Self-Control)이 부족한 아이들이 되어진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인성교육의 첫 시작은 곧 배려심 증진과 자기 절제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인성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상명·광운대 학생들의 의견을 듣다

한승규(상명일교 3): 저는 현재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도 똑같이 인성이 나쁜 아이들은 있었기 때문이죠. 단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은 SNS 를 비롯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쉽게 전달이 되고 말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들은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보다 더 빨리 전달되고 퍼지는 법이죠. 저는 현재 우리 아이들의 인성 실태가 객관적으로 부족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필수(광운법학 3): 저도 한승규 학우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그리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불거진 학교폭력 등도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있었고 부모님 세대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정도와 빈도가 더 많아지고 심해진 것은 사실이죠. 한승규 학우의 말처럼 요즘 각 미디어 매체와 SNS 를 비롯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쉽게 퍼지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요즘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재혁(상명국통 3): 예, 두 학우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단지 요즘 미디어 매체 등의 발달로 인해 너무 부정적인 보도와 이야기들이 쉽게 전달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안좋게 보여진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이전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참된 인성을 가진 모습이 부족하다고 보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성교육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두 학우

김필수(광운법학 3): 저는 그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과도한 미디어 노출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각종 예능에서 다루고 있는 모습등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남을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모습 등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다루다보니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미디어를 보면서 자연스레 이기주의적인 세대가 되어간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승규(상명일교 3): 저는 학습위주의 교육이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예체능 쪽의 교육도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체육 같은 경우 학우들이 함께 협력하고 도우면서 배려심을 증진하게 되고 참된 인성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습위주의 교육을 조금은 지양하고 예체능 교육쪽을 비롯하여 아이들이 함께 배려심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재혁(상명국통 3):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 실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교육의 첫 시작이 배려심 증진과 자기절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좋은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김재혁(상명국통3), 한승규(상명일교3), 김필수(광운법학3)

한승규(상명일교 3): 저는 수업 방식에서 선생님의 일방적인 수업 스타일보다는 학우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배울 수 있는 조별 모임, 좀 더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유행하는 스터디 모임 위주의 학습 방식이 도입되고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조별학습이 학습평가나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함께 토론하며 대화를 나누는 수업을 통해 의견을 조정해나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배려심을 증진시키고 자기의 의견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력도 할 수 있는 참된 인성교육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필수(광운법학 3): 저 역시도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국영수 위주의 학습보다는 도덕이나 윤리수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수업을 주입식이나 암기식 위주의 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 봉사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수업과 평가로 유도함으로써 아이들이 배려심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한 자기 절제력도 기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를 비롯해서 한승규 학우님께서 말씀해주신 예체능 위주의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재혁(상명국통 3):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가지 의견을 제시해 드리자면,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께 자연스럽게 인성적으로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식사 에티켓을 통해 배려심을 자연스럽게 증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셨는데요. 혹시 인성과 관련해서 다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두 학우

김필수(광운법학 3): 인성,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의견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성판단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세대나 한 사람에 대해서 인성이 잘 갖춰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즉 배려심을 잘 갖춘 사람과 자기절제력을 지닌 사람이 참된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인성교육의 첫 시작이 바로 이 둘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재혁(상명국통 3): 네, 오늘 두 학우님들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인성교육의 첫 시작인 배려심 증진과 자기절제력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을지 좋은 방안책과 의견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참된 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⑦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김재희(과기영어 3), 장순호(과기안광 4),
송준행(과기전자 4), 안채윤(과기행정 3), 이정빈(과기행정 3)

김재희(과기영어 3):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성폭행 범죄, '왕따'와 같은 학교폭력, 패륜 동영상 등 청소년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한 단면인데요.

이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창의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론교육, 동아리활동과 같은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스스로 체득하게 하기도 하고, 입학사정관제 인성평가를 넣어 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합니다.

기업에서도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인성면접이나 인적성 검사를 함으로써 말이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핵가족화나 한 부모 가정 등 오히려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하기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아버지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버지가 인성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를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송준행(과기전자 4): 먼저, 아버지는 좋은 가정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이는 처음에 말을 배울 때,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 외에도 예절, 습관 등 모든 것을 가정에서 먼저 배웁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가정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격이 결정되죠. 따라서, 아버지는 좋은 가정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는 토론, 작게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많은 토론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은행원이신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잦은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친구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던패밀리'라는 외국 드라마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를 'buddy(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민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다가가 고민을 털어놓고는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친구 같은 아버지와 가부장적인 아버지, 누구에게 아이들은 고민을 털어놓을까요? 만약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이 친구 같았다면, 아이들이 고민을 아버지에게 더 많이 털어놓고, 부모의 올바른 조언으로 더욱 잘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인성문제도 많이 줄었겠죠.

이를 위해 아버지가 아이와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조기축구회를 같이 하였는데 이것이 아버지와의 좋은 대화거리였습니다. 스포츠든 음악이든 자녀와 아버지가 취미를 공유하면 좋은 대화소재가 생기고 이것이 친밀감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아버지를 넘어서 부모가 공부에 투자할 비용으로 여행에 투자하면 아이 인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자녀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혼자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과 사회를 만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며 좋은 인성함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장순호(과기안광 4): 아버지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잘 놀아주는 친구도, 상담을 잘 해주는 친구도, 좋은 조언이나 꾸지람을 해주는 친구 모두 좋은 친구죠. 따라서, 아버지는 아이와 꾸준히 함께 하여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 아버지는 항상 배움에 힘써야 합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가 해야 할 일들은 다양하고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가 체험 프로그램, 라디오와 같은 교육방송, 아이와의 대화와 운동 등을 통해 계속해서 학습하여 같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정빈(과기행정 3): 저는 아버지가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친구 같기만 하다면, 아이가 친구 사이와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지나치게 친밀하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자녀가 부모를 얕볼 수도 있죠.

앞서 말씀하신 모던패밀리에서 보면, 친구 같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녀의 모습이 조명되기도 합니다. 또,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종혁씨와 이종혁군의 관계가 너무 친구 같다 보니, 때론 부자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두 역할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적절한 품위를 지키며 자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 사이에 하는 장난이 아니라, 아버지의 조언이 아이에게 보다 제대로 전달되어 올바른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채윤(과기행정 3): 아버지는 아이가 받아드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아버지가 좋은 조언을 하고,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여도 아이가 사춘기이고 그것을 받아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너무 다가오려 한다면 아이는 부담스러워 아버지를 더욱 피하거나, 더 큰 반항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믿고 아이가 준비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믿고 지켜봐 주기도 해야 합니다.



김재희(과기영어 3):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버지는 좋은 가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공부보다는 여행에 투자하여 스스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의 의미가 다양하듯 여러 의미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녀와 스포츠와 같은 취미를 공유하여 자녀와 대화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배움을 통해 자녀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있어 아버지로써의 품위를 유지하여 친밀함과 예절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아이 스스로도 아버지의 여러 도움을 받아드릴 수 있어야 하므로, 아버지는 기다려주기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매우 동의합니다. 이렇듯 아버지는 자녀 인성에 있어서 해야 할 역할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모두 느끼시다시피 이는 아버지 혼자만의 노력으론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보다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이정빈(과기행정 3):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은 가부장적 전통을 가진 사회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밥상에서든 어디서든 일방적으로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한 기업의 보스같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상명하달식 방법으로 전해지던 아버지의 조언을 듣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아버지와의 대화나 토론을 장려하기 위해 가부장적 문화를 바꾸려는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접촉시간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충분한 여가시간을 통해 자녀가 아버지와 친밀감을 쌓을 시간이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만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10 위 안에 드는 한국에서는 일하는 아버지와 자식 간에 친밀감을 쌓기란 시간상 어렵죠.

하지만 이는 단연 아버지의 근무시간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의 학습시간도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식 중 맏이가 가장 먼저 귀가를 합니다. 이는 맏이가 가장 먼저 가서, 동생들을 직접

돌보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맞벌이 시대의 엄마라는 관리자 대신 아이들 스스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부모의 대리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이는 부모와 대화할 소재가 생깁니다. 또, 집안일을 나누어 할 수 있어, 부모는 집안일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따라서 아이와 대화할 시간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서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집에서 있어도 자녀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따라서, 자녀의 생활에도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아버지가 가정에 적절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단순히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 있는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 가정의 경제 상태를 걱정하여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일이 쌓이다 보면, 가정 내에 소통 단절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안채윤(과기행정 3): 최근 아버지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인성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이죠.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획일화입니다.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인성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사람의 인성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에 대해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었고, 인성교육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인성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인성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아버지학교, 아버지 자녀교육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방법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아버지 스스로 어떤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인지, 어떤 가치관이 아이에게 전해졌을 때 바람직하게 전달될지 등을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은 방법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관심을 촉구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장순호(과기안광 4): 요즘 '아빠 어디가'나 '붕어빵'과 같이 아버지가 자녀와 어울려 출현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와 많은 교류를 하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가 점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버지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자녀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방송매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자녀교육자로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죠.

또, 기업이나 지역공동체가 아버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먼저 기업에서는 사원들이 가정을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산의 경우, 가정을 위한 휴일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 날 직원은 4 시에 출근할 수 있죠.

이 외에도 기업 측에서 사원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에서 파티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이 기업을 방문하여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회사동료들도 만나고 그들의 가족도 만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유대감도 생기게 하는 것이죠.

지역 공동체에서도 모임이나 파티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요즘 이사와 이직으로 인해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도 모르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임을 통해 자녀도 부모도 공동체에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저절로 인성교육이 될 거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와 기업 내의 노력은 아버지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도 아이와 또 개개인 모두의 공동체 내에서의 인성을 함양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송준행(과기전자 4): 아이의 잘못된 인성으로 인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많은 청소년 문제들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똑같은 기준을 위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시키는 데에 반해, 한국에서는 똑같은 것들을 시키죠. 학원을 통해서 말입니다. 학벌을 보는 취업시장을 위해 아이들은 대학만을 위해 공부합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공부를 하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방법은 없죠.

거기에 미디어는 계속해서 자극적이어지고,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생각할 시간은 없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더 나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 돈만 벌어오려 합니다. 아버지는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되지'라는 인식이 만연해져 있죠.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돈이면 된다는 아버지의 인식제고입니다. 아버지들로 하여금 돈만이 자녀교육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매체에서도,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성교육을 위한 아버지들의 모임도 인성교육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아버지들은 서로 친목도 다지고 아이 인성교육에 대해 의견도 공유합니다. 이를 사회 전반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획일적이지 않고 발전적인 인성교육 방안을 아버지 스스로 찾는 것이죠.

김재희(과기영어 3):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없거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정빈(과기행정 3): 사실 현재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대체 장치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미흡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정책이나 장치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비행청소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은 한 교육자 대 다수의 학생이죠.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니 아이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연필 만들 듯 찍어내는 대량생산이 아니라 아이 하나하나에게 집중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김재희(과기영어 3): 네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풍토 개선, 자녀와 아버지의 접촉시간 증대를 위한 사회의 노력, 아버지에게 경제 활동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정부, 획일적이지 않도록 모임을 통한 아버지 인성교육확대 등 다양하고, 기발하고, 핵심적인 의견들이 많이 공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아버지의 역할이 점차 주목받고 이를 위해 사회가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도 지금부터 아이의 인성교육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귀한 시간과 좋은 의견 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⑧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혜인(숙명홍광 3): 우선 모든 참석자 분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성 교육의 필요성 제고와 인성 교육을 위한 효과적 교육 방안에 대하여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과거 개발 중심 시대에는 양적 측면이 강조된 교육이 이루어졌었지만 지식 기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요즈음에는 상호 작용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창의 · 인성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나누어드린 자료의 내용처럼, 사실 작금의 한국 교육은 인성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토론자 여러분들의 현재 우리 나라 교육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영(숙명국문 2): 제가 KBS 국장님께 들은 말씀 중에 이와 관련하여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핀란드 등의 교육 유럽식 교육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유럽식 교육 형태가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교육 방식이 너무 자유롭고 나태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여덟 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지식을 외우는 주입식 교육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요. 이것이 올바른 교육 방식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무서운 성장 추세에는 이러한 교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선진국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었던 업적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주입식 교육 형태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미선(숙명미디어 3): 일부 동의합니다. 산업 혁명의 경우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혁신적 발달인데요. 주입식 교육은 이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단기간 내에 빠른 성과를 내지요. 주입식 교육을 나쁘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인(숙명홍광 3): 교육 방식에 있어서 무분별한 벤치마킹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같습니다. 저도 이에는 동의하지만, 중국 등 한창 산업화가 진행 중인 국가들은 경제 성장 모형이 따라잡기형(catch up)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이미 몇백 년에 걸쳐 경제 성장을 이룩한 선진국들을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기보다는 정해진 루트대로 빠르게 성장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내에서는 교육 방식 또한, 지식을 양적으로 전달하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따라잡기형 체제가 끝나고 성장이 둔화되는 과도기 상태-즉 한국의 경우-에서는 창조와 인성을 위시한 교육을 해야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산업화 도중이나 경제 발전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따라잡기형 체제 하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산업화 과정을 마친, 성장 둔화세의 과도기 국가에 속합니다. 주입식 교육만을 고수하면 정체될 수 있습니다.

홍다영(숙명컴과 2): 이해가 갑니다. 주입식 교육으로는 앞으로의 미래 변화를 꾀하기가 힘들다는 것인가요? 확실히 종래에는 양적 성장을 해왔으므로 앞으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성장의 기반이 창의 · 인성 교육인 것이구요.

김혜인(숙명홍광 3):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자면, 한국은 지식 주입 위주의 교육에서 창의 · 인성 교육으로 이행해 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선진국의 인성 교육을 본받기보다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 인성 교육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의 창의 · 인성 교육이 우리 나라에 적합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영(숙명국문 2):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창의력에 대한 정의를 가르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본인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교육도 마찬가지구요. 학생들이 책상 앞에서 떠나 현장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 경험을 하려면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창의 ·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식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학생들을 대동한 필드 트립 등의 현장 학습 기회 제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의력 혹은 인성이란 무엇인가” 식의 교육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창의력이나 인성도 가르쳐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구요. 본인이 경험을 통해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박미선(숙명미디어 3):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담임선생님께서 그런 저를 보시고 임시 반장 직을 맡기셨던 적이 있는데요. 그 경험을 계기로 성격도 바뀌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느끼기를 유도하는 교육의 형태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인성이란/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식의 교육은 그 효과에 의문이 듭니다.

홍다영(숙명컴과 2): 사회적으로 대학 입시의 중요성이 너무 크게 인식되어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성 교육보다는 지식 교육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식에게 전이되므로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기 영어 교육을 한다는 부모님들이 주변에 많은데, 유년기에는 영어 교육보다 독서나 가정 환경에서의 인성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학부모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혜인(숙명홍광 3): 어떠한 방식의 창의 · 인성 교육이 우리 나라에 적합할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본 결과, 창의와 인성에 대한 교육은 교실 내에서 학생들에게 그 정의를 가르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인성 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 학과가 다르신데요. 자신의 전공과 연관하여 효과적인 인성 교육에 대한 대책을 이끌어 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미선(숙명미디어 3): 앞서 나왔던 의견인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합니다. 태어나서 첫 번째로 속하게 되는 사회화 기관은 가정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학습하고 모방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의 인성 교육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구요.

최근 핵가족화나 맞벌이 부부의 등장 등 환경적 변화로 인해 같은 상에 앉아 밥을 먹는 시간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밥상머리교육 등 가족 간의 교육 시간이 자연스레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가정 교육의 기회가 없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전수영(숙명국문 2): 국문학도로써 생각해 보자면, 독서를 장려하는 것이 인성 교육에도 효과적이리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하고, 도서의 선정에 있어서도 타인이 정해주는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이해 가능한 도서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자발적 인성 교육이 될 수도 있구요.

김혜인(숙명홍광 3):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가정 내 인성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독서 장려가 효과적 인성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두 가지 의견을 융합하여 가정 내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 교육을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미디어 학과를 복수전공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미디어가 학생들의 인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돌고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인성 교육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보입니다. 미디어와 인성 교육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의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영(숙명국문 2): 언론인들이 미디어가 인성 문제의 주범이라고 책임을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한 학생의 살인 사건을 기자가 미디어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기 위해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보았느냐?” 라는 식의 유도 심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평론가는 내가 배탈이 난 건 마스터쉐프 코리아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책임을 미디어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미디어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 여론은 미디어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컨텐츠를 접한 사람은 폭력성을 띤다는 식으로요.

박미선(숙명미디어 3):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쓴 남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집을 조사해 보니 치한과 관련된 영상물이 있었는데, 평소에 여기서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합니다.

결국 미디어와 인성에 대한 논란은 이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틀을 정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프레이밍 효과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몇의 기사들은 마치 미디어는 인성에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후 기사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홍다영(숙명컴과 2): 확실히 일부는 미디어로 인한 경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인성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컨텐츠를 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미디어를 탓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탓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에서 무분별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장면을 방영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아직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들은 모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청 연령 제한 등의 제도를 확실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김혜인(숙명홍광 3): 세 분 모두 미디어가 인성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과도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가서 더 나아가서 미디어를 인성교육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박미선(숙명미디어 3): 최근 방영되고 있는 “아빠 어디가” 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 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웃음을 위한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이나 출연자들의 올바른 사고 방식 등을 보여줌으로써 인성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수영(숙명국문 2): 방금 말씀하신 “아빠 어디가” 의 기획 의도는 현대 사회에서 사라진 아빠의 역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교육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구요. 미디어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성 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김혜인(숙명홍광 3): 네, 여러분의 말을 정리하자면 미디어는 확실히 인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시청 연령 제한 등의 제도를 통해 관리해야 하지만, 사실상 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만 너무 과장되어 알려진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덧붙여서 인성 교육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아빠 어디가” 라는 예시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평가 방식의 변화는 교육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인성 교육에 대해서도 사정관제나 입사 면접 시 인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교육 자체를 정착시키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과연 인성 교육의 평가는 가능한지 혹은 합당한지, 또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전수영(숙명국문 2): 인성에 대한 평가 방식을 도입할 경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비리에 대한 우려가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 국제학부의 경우 애초에는 입사관제를 통해 선발하려고 하였으나 현재는 80% 정도가 기여입학(돈을 내고 입학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다영(숙명컴과 2): 입사관제나 입사 면접 모두 평가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평가가 주관적이거나, 평가자로 인해 비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평가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사관제나 면접에서 인성 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인성 교육 자체가 암기식이 되어 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입 면접을 보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인성이나 창의력에 대한 질문을 예상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인지는 의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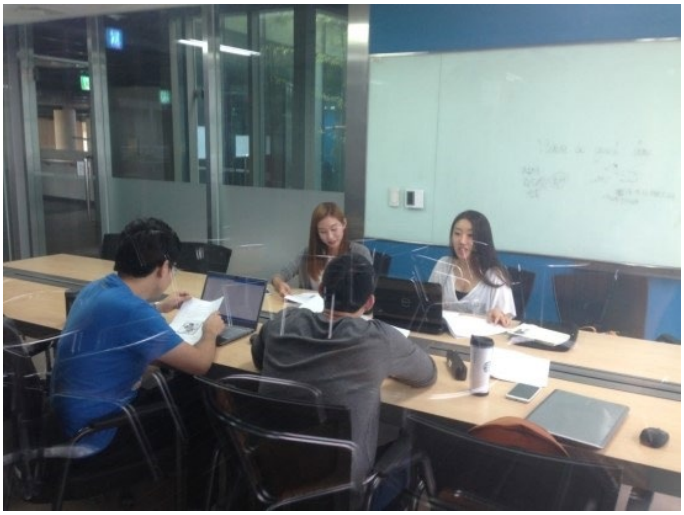
박미선(숙명미디어 3): 평가 방식에 관해서도, 면접이나 입사관제 모두 몇 분의 대화 형태인데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접할 텐데 과연 이 대화를 통해 인성을 모두 알 수 있을까 싶습니다. CJ 의 입사 방식처럼 6 개월 정도의 인턴 과정을 거쳐 길게 평가한다면 모를까, 현재의 방식으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김혜인(숙명홍광 3): 네, 세 분의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인성 교육에 대한 평가 시스템 도입은 인성 교육을 주입식 암기 교육으로 바꾸어 버릴 우려가 있으며, 인성이라는 특질에 대한 평가 자체도 어렵다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또한 비리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가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현재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인성 교육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학과별 의견 및 미디어와 인성 교육의 관계도 고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성 평가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빛내 주신 참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⑨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송예슬(디지털미디어학과 4 학년), 백주아(디지털미디어학과 3 학년)
인현식(디지털미디어학과 4 학년), 양호범(영문과 4 학년)

백주아: 세상에 파렴치한의 범죄와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수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자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요즘 인성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송예슬: 일주일에 학원을 12 개씩 다니는 요즘 아이들은 오로지 공부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학원공부만 소화해도 벅찰 텐데요. 학업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니까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현식: 저는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큰 이유가 공부에만 몰려서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의 세계가 보여주는 자극적인 것들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사회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외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은 성장하지만 내적인 측면의 성장이 더뎌져서 이들이 세상에 나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양호범: 말로 아무리 인성교육을 이야기한다 해도 주변에서 접하는 것은 미디어 즉 소리와 영상으로 보여주는 세계, 자극적인 화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이 그곳에서 보는 세계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문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꾸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모는 아이에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라고 강요하고 학교에서도 명문대를 가라고 강요하는 이런 상황적인 모순이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리게끔 하는 것 같다고 봅니다.

학업에서 얻는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대치동에서 일년에 평균적으로 12 명의 아이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학업 스트레스 외에도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아이들 왕따, 폭력 문제도 인성교육의 부재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주아: 맞습니다. 제 아버지 때만 해도 친구 가방에 침을 뱉고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학생들은 없었다고 해요. 아무리 봐도 요즘 세상엔 너도 나도 싸이코패스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싸이코패스는 남에게 미안함과 고마움과 같은 기본적인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등한 인격체로서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에 대한 조금의 생각도 갖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말로든 행동으로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개인주의의 유입, 미디어를 통해 보여주는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의 능력이 부족해진 데는 다양한 차원의 원인이 있겠지만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나와 다른 너(타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예슬(디지털미디어학과 4 학년)
인현식(디지털미디어학과 4 학년), 양호범(영문과 4 학년)

인현식: 싸이코패스를 양성하는 가장 원초적인 곳이 가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 아이들의 무지막지한 행동이 오히려 정당화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체벌도 금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선생님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대들기도 하고 대드는 학생을 혼내기보다 오히려 부모가 선생을 폭행하는 많은 것이 전도된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송예슬: 체벌을 금하는 제도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 높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효성을 잃은 것 같아요. 미국은 학생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체벌 이외의 다른 처벌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한 문제들이 양상 되는 것 같습니다.

백주아: 그조차도 무언가 전도된 느낌이에요. 체벌이 무서워서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법적으로 처리하려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더 영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송예슬: 마침 제가 어제 집에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인데요, 비가 오는데 초등학생들이 하교하는 길이 굉장히 좁은데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교를 시키는데 일반 사람들도 지나가는 길인데 아이들이 사람들을 치고 가면서 단 한 명도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는 아이들도 없고 선생님들도 그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인현식: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우는 부분이 참 많은데, 예슬이가 지적했던 문제를 제가 진지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길을 지나다가 일본인과 제가 부딪혔는데 제 쪽에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사람이 저에게 '스미마셍'을 먼저 말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 'excuse me'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아침 제가 학교를 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수많은 우리나라 학생, 직장인, 주부들과 부딪혔지만 아무도 제게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지 않더군요. 이러한 시민의식 수준을 가진 어른들이 무슨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백주아: 일본 시민이야기를 하니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우리 테이블에서는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밥을 먹고 잔반을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의 일본인들의 식사 후의 모습은 정말 우리 테이블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었어요.

잔반이 한 군데 가지런히 모아져 있고 자신이 먹은 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런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선진 의식, 시민 의식의 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만 보고 자란 일본 아이들과 우리 나라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청소년 범죄율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송예슬(디지털미디어학과 4 학년), 양호범(영문과 학년)

양호범: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모범적인 모습을 솔선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예슬: 어른들이 자기만 알고 자기 자식만 중요한 줄 아니까 아이들 역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전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임에도 자신의 편리를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덜한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에서 비롯하는 것일 까요?

백주아: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된 인문학 교육의 절실함을 논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통적인 공동체 주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개인주의에 근간인 개인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을 하는 어른들 본인 스스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 제도만 아무리 바꾼다고 한들 인성교육이 제대로 정착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인데 말이죠.

송예슬: 동의합니다. 아무리 입시제도를 뜯어 고치려고 한들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제도가 사람들을 바꿀 수 없는 노릇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개인, 자유, 공감이 무언가를 알려주려면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주아: 예슬이가 방금 말한 부분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미리 보내준 토론문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인문학 교육인데요, 인문학 교육은 유명한 석학의 인문학 서적을 읽고 그를 암기하는 교육이 인문학 교육이 아닙니다. 인문학 교육의 기본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와 다른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궁극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본인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해보면서 나의 존재를 파악하고, 나와 다른 남의 실재를 받아들이면서 나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남을 받아들이는 체험의 과정이 인문학 교육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현식: 그런 커다란 부분이 인문학 교육이라면 그러한 교육이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어려울 것 같네요.
양호범: 인문학이라 하여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렵게 다가왔는데 체험과 공감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진정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윤리 수업 때 삼강오륜을 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왜 우리가 어른을 공경 해야 하는가, 친구와 부부 사이의 예절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어려운 한자를 암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까? 도덕성이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것을 안다기 보다는 그저 시험이나 잘 보자고 도덕 교육을 받는 게 아닐 것인데 말이죠.

백주아: 예, 맞습니다.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맹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어떠한 배경에서 맹자가 이러한 주장을 했고 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가, 그래서 지금 맹자가 현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깊게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하는 거죠.

초중고를 거치면서 암기의 범위와 양만 점점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자와 석학들의 의견이 왜 나왔고 그것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를 학생들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아이들이 그것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성을 느끼면서 학생들의 인성도 점점 더 성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현식: 내용은 참 정말 좋은데, 제가 다만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바뀐다면 그에 상응하여 교육 제도 역시 바뀌어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 3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맹자가 살던 시대에는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 운을 뗀다 한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인문학 교육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이야기는 상당히 높은 차원의 교육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어릴 때부터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천하고 그에 맞는 제도 또한 마련을 한 뒤에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지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 제도, 내용이 도입된다 한들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기술수준과 문화수준의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가르친들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 벌어지는 간격의 차이를 메울 수 없음에서 문제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백주아: 네, 그런 부작용 또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교육의 내용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개혁이라는 게 참 한 부분만을 건드린다고 올바르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행 교육 체계를 정말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면 정말 세상을 뒤엎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송예슬: 교육의 내용과 함께 제도도 바꾸면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진학 이후 대학을 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을 가는 거지 반드시 대학을 가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꾸준히 찾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다들 부화뇌동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백주아: 네 맞습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을 동전 뒤집듯이 확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라도 교육의 내용을 수정해 나가면서 그 인식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인문학 교육 역시 성급하게 진행되어서 되려 문제만 생성할 수 있는 요지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잘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송예슬: 그렇게 생각해보면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인성교육을 인문학으로 풀어나가는 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해도 단계적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선 상당한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인현식: 어렵다고 하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 교육의 실태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야지요. 학교에서 인문학으로 체험과 실습위주의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인문학에 대한 지식을 가볍게라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양호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전에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모든 아이들의 가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과 대화의 부족에 기인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고민을 나누고 동시에 아이들에게 좋은 지식도 전달하면 그만한 교육이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송예슬: 바쁜 현대사회의 일상에 치이다 보니 가족끼리 밥 한끼 먹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와 부모님과 상 펴고 앉아서 함께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엔 각자가 너무도 바쁘기 때문에 어떨 땐 하루에 한 끼조차 같이 식사할 때가 없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백주아: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은 부모님과 자꾸 더 소원해지고 특히 요즘 인터넷 게임 산업이 무분별하게 어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여 공격하다 보니 놀이터에서 도무지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들 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공격적인 게임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공격성 또한 자꾸 심해지는 문제도 있고요.

인현식: 미디어를 생산하는 주체들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적 집에서 위인전과 동화책을 읽던 그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교육, 그러한 교육이 지금 주아가 이야기하는 인성교육의 해법으로 인문학을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예슬(디지털미디어학과 4 학년), 백주아(디지털미디어학과 3 학년)
인현식(디지털미디어학과 4 학년), 양호범(영문과 4 학년)

백주아: 오늘 인성교육-인문학 이외에도 참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본 것 같습니다.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인성교육-인문학에서 해법을 찾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마디씩하고 오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송예슬: 지금 분명 우리사회는 문제가 있고 이대로 가다 보면 작은 문제가 나중에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미리부터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작은 부분에서부터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참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교육의 내용을 보완해 나간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현식: 어떤 것을 바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인성교육의 거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점진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 제도든 내용이든 커다란 혁신적인 무언가 없다면 지금의 문제적 상황을 쉽사리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대안이 있다면 한번쯤은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호범: 무언가 큰 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옛날보다 요즘 아이들의 인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 했던 밥상머리 교육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을 잘 실천하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의 태도와 인식 또한 변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주아: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승주(경영4), 최승연(신방4),이재은(경영4),이정구(경영4)

이승주(경영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여러 과제들 중 최근 사회적으로 교권 추락, 청소년 범죄 증가문제등과 관련하여 인성교육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 졌지만 어떤 점들이 문제였기에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것일까요?

이정구(경영 4): 투입에 따른 산출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 받은 인성교육은 일주일 중 하루만 인성교육 관련 VOD 시청이 전부였습니다. 교육부의 지시로 인해 수업 커리큘럼에 인성교육을 낮은 비중으로 넣기만 했지 성과측정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봅니다.

이재은(경영 4): 한국사회가 어릴 때부터 명문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대학생 때는 대기업에 취직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존재 하다 보니 인성교육이 진행된다고 한들, 받는 학생들은 경쟁과열의 사회에서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방법론이 아니라, 인성교육 자체가 먹혀 들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최승연(신방 4): 저는 담당자들로 하여금 인성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서 성과가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 담당자인 학교 교사들은 교육부 지시대로 피상적인 교육만 할 뿐, 성과 평가를 하고 능률을 올릴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승주(경영 4):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사회가 경쟁위주 사회라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큰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하며,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낮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제기해주신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요구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구(경영 4): 투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승연씨가 언급하셨던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될 거 같습니다. 교사 독자적으로 인성교육 강화 프로젝트를 구축할 재량을 주는 것이지요. 아울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과 위원회 신설이 필요할 것 입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 학부모를 참가시키면 투명성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은(경영 4): 한국사회의 경쟁 과열적 환경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필요 의식을 일깨우는 작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성 교육 필요성 고취를 위해 공익 캠페인 공모전 개최나 학생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오는 인기 스타 등을 출연시켜서 창의적인 발상의 인성교육용 VOD 를 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최승연(신방 4): 교사의 인성교육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는 그 선결과제로 교육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기 위해 이권과 관계된 큰 프로젝트만 신경 쓰고 정작 교육문제처럼 고질적이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은 뒷전에 미루는 일이 빈번한 편인데, 이러한 관행이 해결되어야 교사들도 동기부여가 되어서 인성교육의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주(경영 4): 해결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최승연씨가 언급하신 내용 중,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위한 프로젝트만을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교육 같은 본질적 문제들은 경시되어 저예산으로 운영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해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의 칼럼에서 제시한 사제간 소통강화를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구(경영 4): 사제간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선생님과 가까워지면 수업에 대한 관심도와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도 상승하므로 자연스럽게 비행을 덜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한 방안으로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재은(경영 4): 문제는 방법 같습니다. 사제 간 소통강화가 잘만 된다면 훌륭한 인성교육이 될 수 있지만, 요즘처럼 사교육 과열의 환경속에서 사제 간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방과 후 교사가 아이들과 축구를 한다고 해도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이들을 통제의 차원에서 지나치게 가까워질 수도 없는 노릇이죠.

최승연(신방 4): 그러고 보면 인성교육 부재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주체로 초중고 교사가 먼저 거론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교사는 현행 업무 상 행정업무, 학생통제, 수업 질 향상, 학생 개인 상담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아서 인성교육을 위해 학생들과의 소통에만 100 중 70 을 쏟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승주(경영 4): 지금까지 공교육 영역에서 한국 선진화 과제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인성교육 강화의 실질적 방법들을 논의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들을 공유해주셨는데 공통적인 사항은 정부의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⑪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임성현(경희경영 3):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재 인성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효(경희경영 3):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이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순천에서 일어난 고등학생 폐륜 사건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인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학생일 때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동민(경희경영 3): 우리 때는 안 이랬는데 요즘 학생들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사고를 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등 인성교육이 잘못되었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 학창시절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지금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에 교육을 받아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도 인성이 제대로 되어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인성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는 단어 때문에 학생들에게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막말 등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러한 분들부터 인성에 대해 신경을 안쓰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바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현(경희경영 3): 저도 사회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 찬성합니다. 인성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은 물론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데 우리 사회 분위기는 인성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협동을 무시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경쟁만 가르치는 이 사회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등만 알아주는 상황에서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 점점 혼자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인식도 학생들의 인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성현(경희경영3), 이희철(경희경영3), 최승효(경희경영3), 박동민(경희경영3)

임성현(경희경영 3): 현재 우리 정부는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학교교육에 더욱 초점에 맞추어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학교들이 인성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의견을 교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인성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인성에 대해 배우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처벌 등의 수단을 통해 학생들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지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성을 가르칠만한 수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체벌을 가하면 학부모들이 달려와 교사의 무릎을 꿇리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인성교육이 아닌 성적만을 강조하면서 선생님들의 인성교육 자체를 막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인성교육이 점점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 또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박동민(경희경영 3): 학교에서 인성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교육을 한들 학생들이 진지하게 그런 교육을 들을지도 의문입니다. 억지로 학교 과정 속에 인성교육을 집어 넣는다면 학생들은 단지 그 시간을 쉬는시간이라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강요해서 인성교육 시간을 할당하더라도 시행되기 어려울 뿐더러 현재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보았을 때 그 시간에 차라리 자습을 지켜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학교 측에서도 순순히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따로 인성교육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가르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최승효(경희경영 3): 대학 입시에만 몰두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둘째치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체육시간에도 체육이 아닌 교실 내에서 자습을 강요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인성교육을 한 과목으로 지정해봤자 많은 학교들은 이를 자습시간에 이용할 것이 뻔합니다.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학생들의 인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인성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무리하게 정부에서 과목을 지정해서 인성을 가르치려 한다면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도 가르치면서 의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을 따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성교육이 진짜 필요하다는 인식, 우리의 인성교육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문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과목을 새로 만들어 가르친들 학생이나 선생님은 물론 학부모들도 인성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흐지부지하게 인성교육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동민(경희경영 3): 자료(토론문 요약)를 보니 우리 정부가 세운 정책들이 인성교육을 잘해야 인재가 된다라는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순수하게 가르쳐야 하는 인성교육을 마치 외국어 하나를 더 잘해야 한다는 식의 스팩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승효(경희경영 3): 저도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인성교육이 자칫 다른 과목처럼 대입을 위해 필요한 과목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입시를 위해 필요한 과목이 되어버리면 우리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성을 가르치기보다는 다른 과목처럼 주입식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동민(경희경영3), 임성현(경희경영3), 이희철(경희경영3)

임성현(경희경영 3): 현재 인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마치 국사교육에 대한 정책과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역사의식이 부족하다고 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모습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입시나 취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인성교육이 실현되기보다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한 과목이 추가되어 부담만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인성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육으로 2 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1 등을 하고 있는 핀란드와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웃으면서 공부하는 핀란드 학생들에 비해 울면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모습만 봐도 인성교육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협동을 중시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인성교육도 장기적으로 경쟁보다는 협동을 중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례이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교육시스템을 갖고 와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스템을 가져와도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다 보니 협동을 가르치기 쉽지 않을 뿐더러 학우들과 더불어 팀을 이루어 협동을 배우더라도 그 안에서 경쟁이 발생해 선진국들처럼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박동민(경희경영 3): 핀란드나 다른 선진국의 경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방식을 고수해왔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단순히 선진국들의 교육 방식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많은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최승효(경희경영 3): 지금 시작해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쯤 갔을 때 성과를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 이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이런 정책들이 잘 뿌리내리고 있더라고 우리가 현재 배워오던 경쟁이라는 개념과 아이들이 배우는 협동이라는 개념의 차이로 인해 또 다른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단기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 없고 선진국을 따라가려다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협동으로 맞추면서 교육 또한 서서히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정책이다 보니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기 쉽지 않은 면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 특성상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정책이 성공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이러한 정책을 하자고 주장하고 밀어붙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그만큼 사회도 빠른 속도로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광복 이후 오로지 경쟁만을 강조해왔습니다. 과연 경쟁 문화를 협동하는 문화로 바꿀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성현(경희경영3), 이희철(경희경영3), 최승효(경희경영3), 박동민(경희경영3)

임성현(경희경영 3): 분명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지나친 경쟁만을 강조하는 사회문화를 협동하는 문화로 바꾸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성교육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까?

박동민(경희경영 3): 학교에서 가르치는 인성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성은 가정에서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가장 먼저 부모를 보고 성장하고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모든 부모의 인성을 교육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교육과 학부모가 함께 자녀들의 인성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인성교육을 인식시킬 수 있는 홍보나 강연을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고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체크해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의 인성도 올바르게 교육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정부 차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현재 자녀들의 인성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위험성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무너진 교권을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서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무런 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의 책임의식도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지나치게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체벌은 허용함으로써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잘못에 지도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승효(경희경영 3):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나친 경쟁 구조로 인해 인성을 배울 시간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교육되어야 하는 덕목이지만 그럴 여유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보다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협동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은 시행착오가 많고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교육이 앞으로 무조건 나아갈 길임을 봤을 때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성현(경희경영 3):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재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 인성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⑫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4): 오늘 토론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매 맞는 선생님, 지하철 막말 남 등 언론매체를 통해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여러 개 접하였는데요

오늘 토론은 이러한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학교나 아니면 다른 처벌강화로 정착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제로 토론하기 전에 그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의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씩 돌아가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우리 나라가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나 성적 우수자 중심의 한 줄 세우기식 교육이 계속 되었고 그 속에서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교육이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참교육 혹은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이 배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그로 인한 자살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의 완성과 자아실현의 장이 되어야 할 교육이 계층이나 신분상승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나정(한림대 러시아학과 3): 저는 청소년들이 주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데 학교교육, 인성이 가장 만들어지는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생각되는데, 그 시기에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의식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교사들도 막상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막막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지도를 연구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도 높은 것도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인성교육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인성교육이라는 한 주제 자체가 너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관심도 적고 교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여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우(한림대 철학과 4): 제가 생각하는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학교가 안고 있는 열악한 환경과 분위기가 인성교육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은 바로 과밀학급으로 인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가 부족하고, 있다 해도 매우 형식적인 대화뿐입니다. 또한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아이들, 학부모, 사회 분위기로 인한 교사의 권위 추락 등이 총체적인 인성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부터 한민우(철학4), 한정호(재무금융3)
김광래(재무금융4), 고나정(러시아3)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네 세분의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현재까지 여러분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정호 학우님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인성교육 보다는 신분상승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선생님들의 문제점과 저희 전체적인 시스템을 문제점으로 꼬집어 주셨습니다.

또한 고나정 학우님은 학교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노력이 부족하고 또한 그 노력을 하기 위한 환경조차도 부족하다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민우 학우께서는 열악한 학교 환경 분위기를 문제점으로 학생과 부모, 교사 간의 신뢰부족과 교권추락 등을 말씀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 주제인 처벌강화와 인성교육의 정착에 관해 애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나정 학우님부터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나정(러시아 3): 저는 인성교육 정착을 위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처벌강화를 통한 인성교육은 단기간에 반짝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그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처벌강화 보다는 우리만의 인성교육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를 예로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 문제 예방에 있어 방관자 역할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키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의 수업, 영상물, 게임, 소 그룹 활동 등 학생들이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06 년 핀란드 정부가 투르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핀란드 90% 이상의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학교는 최소 세 명의 교직원을 학교의 키바 팀에 합류시키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교직원들이 키바 유니폼을 착용하고서 순찰돌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정서와 분위기에 맞는 인성교육 시스템을 새로 만들거나 적절한 수용을 통해 우리만의 방식으로 접목시키면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정호(재무금융 3): 저는 처벌강화에 따라서 인성교육이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나라, 앞에 말씀하신 핀란드나 이런 것들의 좋은 교육시스템이 있지만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좋은 환경이나 높은 임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분류도 많을 뿐더러 한국처럼 교육의 열기와 대학의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자체가 서로 다른데 유럽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많이 제한되어 있고, 무분별한 처벌은 금지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한정호(재무금융3), 한민우(철학과3)
고나정(러시아3)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하는지 다른 의견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자체는 유럽과 좀 다른 입시위주의 교육입니다. 1 차원 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때 불이익이 되는 처벌을 생각해 보았는데, 앞으로의 대학지원에 앞서 각 대학에 학생들의 인성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세부적으로 전달한다거나, 내신점수 삭감 같은 것이 단순하고 무식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민우(철학과 4): 저는 방금 말씀하신 한정호 학우님의 의견과 처벌강화로 인성교육을 정착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내신점수 삭감과 대학입학에 있어 패널티를 주는 것이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커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에 앞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교육은 점점 약해지고 사교육이 강해지는데 반면 유럽은 자율교육을 선택해 성적위주의 교육보다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창의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 면접 시 인성 면접의 비중을 3~40% 두면서 개인의 인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독일같은 경우도 열린 토론 수업으로 학생 개개인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며, 잘 들어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호 학우님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 도입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위에 언급한 예시들은 도입에 크게 문제점이 없으며 도입 시 막말과 같은 인성교육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한민우 학우님의 말씀에 한정호 학우님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저는 일단 계속적으로 도입에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우리나라와 유럽 자체는 교육 시스템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입시키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여기서 보면 독일같이 수업을 토론 위주로 하는 것은 교육시스템이 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면 토론수업 같은 것은 물론 말 그대로 토론을 할 수는 있겠죠. 이게 정작 우리나라 현 시스템을 보면 누가 토론을 하고 싶겠어요.

입시위주의 교육이 계속되고 잇는데 애들이 갑자기 토론수업을 하자 진행을 해요 그럼 애들은 막상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럼 애들은 토론을 하고 싶겠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토론을 할 수는 있었겠는데,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도입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한민우 학우님은 한정호 학우님과의 입장이 계속 부딪히는 입장인데, 더 의견 내실 것 없으신가요?

한민우(한림대 철학과 4): 제가 대학교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도 면접을 교수님이 보는 게 아니라, 열명 가량 토론식으로 같이 면접을 같이 보더군요. 의외로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그럼 그렇게 면접을 통해 토론을 해보셨는데, 해 본 결과,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민우(한림대 철학과 4): 네. 자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를 내기가 일쑤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성을 파악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근데 이렇게 대학 입시가 걸리고 교수님들이 앞에 계신데, 아무리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교수님 앞에서 화를 낼까요?

한민우(한림대 철학과 4): 개념 없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아 그런가요? 그리고 아까 고나정 학우님께서는 핀란드 키바 프로그램을 말씀해주셨는데요. 혹시 주변에 그 봉사활동 하는 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약간 복지사 같은 일하는 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고나정(한림대 러시아학과 4): 네. 제가 복지사 쪽은 잘 모르겠고, 제가 이런 키바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나라의 그런 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인성교육을 위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벌을 강화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또 다른 단기간의 효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처벌은 일어난 후의 수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예방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청소년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더 올바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처벌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예방 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그럼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키바 프로그램을 핀란드에서 했잖아요. 그럼 핀란드에서는 인성교육 문제점 같은 게 많이 해악이 되었나요?

고나정(한림대 러시아학과 4): 이게 핀란드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청소년친구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아예 격리를 시켜서 한다는 걸 봤어요. 그런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끼리 합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자고 음식도 다 만들고 생활을 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점보다는 키바 프로그램이 좀 더 인정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더 추천하고 이게 가장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고나형 학우님께서는 약간 비용 측면에서도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처벌강화가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한정우 학우님께서는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물론 인성교육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인성교육의 효과가 얼만큼이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인성교육을 예방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성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에요, 입시위주.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 한국의 이런 시스템들이 인성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조화스럽지 않나 생각 돼서.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우리나라 대학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세 배정도 많고, 대학진학률도 거의 세계에서 일등이래요. 80 프로 정도 되고.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버려서..

대학 관련 패널티를 준다면 더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민우 학우님께서는 아까 처벌강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주셨잖아요. 지금 생각이 약간 바뀐 게 있으신가요?

한민우(한림대 철학과 4): 아뇨, 전혀 없어요. 왜냐면 패널티를 주는 것이 계속 실수를 해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 한번의 실수로 3 년 동안 준비해온 대학입학에 있어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근데 단 한번의 실수라도 선생님한테 폭언을 한다던가 대든다던가 이런 것은 한번의 실수치고는 중대한 실수 아닌가요?

한민우(철학과 4): 중대한 실수이긴 한데,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

고나정(한림대 러시아학과 4): 요즘 입시가 많이 문제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처럼 내신, 수능에 의한 입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고등학교, 청소년기에 활동을 한 것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서 특별전형식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대학입시를 중요시하고 있는 우리 나라도 좀 더 학생들의 인성이라던가 공부 외적인 면에도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런 것을 좀 더 청소년들에게 강조하고 인성의 중요성을 어른들도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우리나라는 물론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인성교육 같은 거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강조하고 다른 나라도 강조하고.. 그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극을 받아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애시당초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네 자식들은 조기교육을 권한다는 거에요.

그런 게 이제 인성교육은 중요하다고 떠들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조기교육을 보내고, 한국말보다 영어를 먼저 가르치고, 학습지를 통해서 수학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이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온 게 인성교육이 아니라 영어나 수학 같은 이런 나중에 좋은 고등학교, 대학을 위해 하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것 들이란 말이에요.

유치원에서 인성교육을 가르치면 좋겠죠. 그런데 요즘 유치원에서도 누가 물건을 같이 나눠 쓰는걸 배우는 게 아니고, 알파벳을 배우고, 덧셈을 배우고, 구구단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대문에 애당초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광래(재무금융 4):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주제가 처벌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정착하자잖아요. 아까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신삭감이랑 대학갈 때 패널티가 있었는데 두 가지 말고도 처벌을 어떤 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 좀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내신삭감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다른 방법이라면..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대학 못 가는 게 가장 큰 불이익이긴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강력한 처벌일지 좀 의견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현재는 퇴학이나 전학이 가장 큰 강력한 처벌이긴 한데, 퇴학이나 전학을 한다 해도 한번 실수를 저지른 학생이 전학을 가서도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처벌이 무엇인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한가지씩 말씀해주세요.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보통, 그런 문제 청소년 친구들은…

김광래(재무금융 4): 한민우 학우님은 처벌에 대해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한민우(한림대 철학과 4): 정학이나 퇴학은 그런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학생들의 꿈을 한번 더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정학이나 퇴학은 아닌 것 같고,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등 그런 활동을 통해 자신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나정(한림대 러시아학과 4): 한민우 학우님께서 말해주신 교내봉사, 사회봉사 활동도 처벌 강화 쪽은 아니고 학생들의 인성에 힘쓰는 배려적인 차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학이나 퇴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낙인을 찍는 거지, 이게 청소년들의 인성을 위한 도구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김광래(재무금융 4): 한정호 학우님은 생각해 내신 게 있으신가요?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혹시 한민우 학우님이나 고나정 학우님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셨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혹시 처벌 강화라는 게 있었나요?

한민우(한림대 철학과 4): 처벌강화 같은 건 없었고요. 미국에서 초등학생 대상을 한 교육이 하나 있었는데요. 뚱뚱하고 키 작은 어린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당하는 이유가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 자기가 왕따를 당하는지, 왕따를 왜 시키는지.

교사가 실험을 하나 하는데 키 큰 학우와 키 작은 학우가 있는데 키 작은 학우는 우등생, 키 큰 학우는 열등생으로 해서 키 큰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 다 무시하고, 키 작은 애들은 어떤 말을 해도 칭찬을 해주는 그런 훈련을 통해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의 기분을 알게 되면서 왕따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저도 TV 에서 봤어요. 왕따 당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선생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왕따를 당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왕따의 심정을 이해하고 왕따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중고등학교에 도입하면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나정(한림대 러시아학과 4): 제가 말씀 드린 키바 프로그램같은 것도 친구들 사이에서 소 그룹 활동 이런걸 통해서 충분히 다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놀이를 하거나 게임을 해보면서 그런 식으로 체험을 해보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친구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네 세 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고나정 학우님께서는 처벌강화에 반대하면서 핀란드의 키바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한국에서도 한국식에 맞게 바꿔 실행하거나 도입을 하자 라는 의견 제시해 주었고요.

한정호 학우님은 유럽의 분위기와 교육 시스템이 한국의 분위기와 다른데 교육시스템보다는 1 차원적으로 내신 성적삭감이나 대학 입학 시 패널티를 주자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민우 학우님께서는 영국의 입시면접, 독일의 토론수업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고나형 학우님과 같이 한국에 도입해 인성교육을 정착시키자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애기해주신 의견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각자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왼쪽부터 한정호(재무금융3), 고나정(러시아3)
김광래(재무금융4, 한민우(철학4)

제가 먼저 말하자면 저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 약간 인성교육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중기적인 인성교육의 계획 수립과 이에 적합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테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생행동의 발달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배려와 공동체 조성,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지역공동체를 만나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를 실제로 체험하고 실천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프로젝트를 수립하면서 실천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는 추진업무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해서 학생, 교사, 학교장, 교육장, 지역주민들과 인성교육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인성교육에 효과적인 실천을 통해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떤지 제안해보고 싶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한가지씩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나정(한림대 러시아학과 3): 김광래 학우님의 의견도 좋습니다만, 저는 자체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건 참여율이 저조해서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에서도 관리자 위치에 있는 교육감이라던가 교육장, 교장들 이런 분들에게 청소년기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그들에게 남다른 인성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주는 거에요.

이분들이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인성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학교랑 교사들이 평가를 해서 그에 맞는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잇도록 하는 것도 실제 인성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에요?

고나정(한림대 러시아학과 4): 막연하게 우선 관리자 위치의 분들에게 의식변화를 시키고 이걸 수업시간에 적절히 투입을 시키는 거에요.

현재 같은 경우는 도덕 같은 이런 입시 중요시되지 않는 이런 과목들은 점점 더 과목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수업과 내신 입시에 관련이 없다고 빼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있는 이 수업시간을 잘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수업시간 내에서 충분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거에요.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저는 질문이 잇는데, 여기서 높은 직위의 분들을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약간 형식적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나정(한림대 러시아학과 4):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표라거나, 평가지표가 있을 텐데 그거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면 평가지표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인성교육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그럼 평가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교육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평가표. 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한민우 학우님 먼저 의견 제시 부탁 드립니다.

한민우(한림대 철학과 4): 저는 요즘 건강과 사회라는 교양과목을 듣는데요. 인성은 80%가 유년시절에 정착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 영어나 수학, 유학보다는 조기에 실천할 수 있는 유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완성된 다음에 학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인성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교육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 생각합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유년시절부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가지 예로 유치원서부터 말씀하셨듯이 조기교육을 많이 하는데 유년시절부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민우(한림대 철학과 4):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예절교육이 있겠죠. 예전에 했던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을 보면 아이들이 버릇없거나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절교육을 통해 먼저 배움을 통한다면 훨씬 나아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그런데 이렇게 저는 약간 한국부모님들이 자기자식에게 과잉보호도 있고, 자기자식이 성공해서 자기의 대리만족을 하려고 한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조기인성교육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극단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을 폐지하는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기과목위주의 시험을 폐지하고, 인성능력이나 자기의 창의성이나 자기의 개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서 아까 말했던 토론 등을 하는 게 많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나정(한림대 러시아학과 3): 김광래 학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들이 점점 자기자식에 대한 과잉보호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동들이 늘어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세대도 그렇지만 형제자매 속에서의 배려라던가 라는 것보다는 개개인에게만 관심을 가졌고, 내가 먼저고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고 때문에 좀 인성에 대한 걸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게 아닌가 합니다.

김광래 학우님께서 말한 것처럼 토론이라던가 이런 어린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역할놀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단체생활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한정호 학우님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이런걸 하려면 물론 빠르면 학생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역할놀이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걸 지금 기성세대 선생들조차도 인성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 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인성교육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수업방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애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프로그램 자체가 있어도 진행하기 어렵고, 인성교육발달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선생님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요새 교권추락에 관한 문제가 많아 제가 조사해 봤는데, 학교에서 하는 교사가 학생을 처벌하는 걸 많이 제한을 하더라구요. 이런걸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교권침해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교권침해요? 물론 애들을 때려서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교사들이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도 무시를 하기 시작하고,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다시 강조하는데 선생님들이 애당초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폭력적으로 대한다거나 언성을 높여서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면서 나아가면 인성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너무 권위주의적인 선생님들을 봐서는 그건 교권침해라기보다는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선생님들이 먼저 위선적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뉴스를 본 게 남학생이 여선생님이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비아냥거려서 여선생이 처벌을 가했고, 학생이 부모에게 말한 뒤 부모가 학교로 와서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비아냥거리는 것도 선생님이 위선적이라 그런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지금 말씀하시는 사건은 중 고등학교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건 처음의 토론 주제인,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을 중점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시기에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 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중 고등학교 교사들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네, 세 분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성교육 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인 인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고나정 학우님께서는 교내 높은 직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성교육의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정호 학우님께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선적인 선생님의 모습보다 먼저 모범을 보이고 언행일치 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민우 학우님께서는 유년시절 인성의 80% 완성된다고 해주시면서 조기 교육프로그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인성교육이 정착하려면 학교에서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 사회나 가정에서 어떤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고나정 학우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고나정(한림대 러시아학과 3): 우리나라도 점점 복지가 발전하고 있고 청소년 친구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청소년 기관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서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받을 수 없는 교육, 교과외적인 교육들을 해당 지원 기관들을 통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적인 국어나 덧셈들은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왜 우리의 역사가 소중하고 이런걸 배우고 가르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과중심의 이론적인 게 주가 되는 학교의 이런 한계를 청소년 기관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행동이 올바른 것이구나 라는 걸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학교 밖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학교 내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도덕이나 미술, 체육, 성교육들이 국영수에 비해 한 시간, 두 시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비중이 더 높은걸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먼저 수업 비중자체를 도덕 등 비주류 과목을 더 늘려주고, 성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외부에서 초빙해오는데, 이러지 말고 내부에 해당 선생님이 상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걸 먼저 시작해야지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하게 될 경우에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리적으로 멀어 이동이 힘들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활동하는 곳까지 가는 차비나, 식비를 대기 힘들 수도 있고.. 그런 외부활동보다는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받는 것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나정(한림대 러시아학과 3): 외부지원의 의견이 나와 제시했지만, 한정우 학우님처럼 저도 도덕 교과가 좀 더 중요시됐으면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도덕과목들은 내신에서도 비중이 적고 수업하는 과정에서도 책 읽기에 급급했는데요. 이것보다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최대화하여 도덕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실천과 활동을 하는 거죠,.

좀 더 덧붙이자면 도덕적 가치 규범에 대한 피상적 이해나 암기위주의 지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실천과 활동, 토론 중심의 교육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주요 가치나 덕목을 인격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차원이 조화롭게 발달하고 청소년들의 사상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우(한림대 철학과 4): 도덕과 수업도 좋고 다른 나라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정 및 사회와의 협력에 의한 인성교육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시스템이 있어도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효과는 분명히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스마트 폰과 기타 이유로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도 인성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저도 한민우 학우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역으로 부모님들의 과잉보호가 오히려 인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의 선생님들 폭행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자신의 아이들을 과잉보호 하는 데에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민우(한림대 철학과 4): 저도 부모님들의 과잉보호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게 말한 취지는 맞벌이나 스마트 폰의 증가로 인한 소통이 단절된 실태를 문제점으로 생각해,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증가를 인성교육을 해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아까 나온 것 중에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게 나왔는데, 저도 요즘 스마트 폰으로 인해 가족간의 외식에서도 대화보다는 스마트 폰을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지, 또한 부모님과의 대화가 인성교육에 해결이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정호(한림대 재무금융 3): 지금 사춘기를 기점으로 보통 대화가 단절되는데, 그런 대화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광래(한림대 재무금융 4): 그럼 가족 간에 대화가 인성교육을 해결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고나정(한림대 러시아학과 3):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모자녀 간 대화가 많아질수록 부모들도 내자식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알 수 있고, 자식들도 자신의 생각을 부모에게 말함으로써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왼쪽부터 김광래(재무금융4), 고나정(러시아3)
한정호 (재무금융3)

김광래(재무금융 4): 네 오늘 인성교육 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교육의 문제점의 원인, 두 번째는 인성교육과 처벌강화, 세 번째는 인성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실천방안 , 마지막으로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 정착을 위해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지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⑬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김민정(국제무역3), 곽성원(경제학 3), 신호준(경제학 3), 조낙현(경제학 3), 이지현(국제무역 3)

김민정(동아국무 3): 귀한 시간 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인성교육의 부재라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의 취업준비에서도 인성평가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과정은 획일화된 교육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준비하는 스펙 쌓기는 익숙하지만, 인성평가는 도통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청년들에게는 취업준비 요건이 하나 더 늘어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취업문제, 세대 간의 갈등, 학교폭력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불리는 인성, 인성교육 어떻게 정착하면 좋을까요?



왼쪽부터 위 조낙현 (경제학 3), 신호준(경제학 3), 곽성원(경제학 3), 오른쪽 위 이지현(국제무역 3), 이윤정(국제무역 3)

곽성원(부경경제 3): 저는 다양한 인성문제의 원인이 사회분위기의 변화에서 왔다고 생각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스컴의 발달은 노래, 영화 등에서

많은 폭력적, 성적인 것들을 어린 나이부터 접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원하는 화려한 것들만 중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는 특성이 있는데 많은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접하여 사회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 졌지만, 우리의 인성교육은 제자리입니다. 자극적인 것들만 즐기게 되고, 예로부터 중시하던 예의나 인성은 따분하게 느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지현(동아국무 3): 네 저도 곽성원 학우님에 말에 공감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도 스마트폰으로 SNS 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폭력적인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폭력적인 것을 접하고 폭력성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많은 학교 폭력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낙현(부경경제 3): 사회는 변화하였지만, 과거부터 해오던 교과위주의 교육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방된 사회에 맞춰진 교육체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입시위주의 사회분위기는 우리의 정서와 인성을 더욱 메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교육체제가 학습자들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게 체험활동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윤정(동아국무 3): 인성교육,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인성교육이 떠오르게 것은 획일화된 교육으로 스펙 위주의 사회가 되었으나, 스펙이 기업의 업무 적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에 들어가면 스펙과는 관련 없이 재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준비한 스펙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인성평가를 시험형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으로는 한 사람의 인성을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몇몇 대기업들은 인성면접, 합숙 등으로 다양한 인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왼쪽부터 위 이지현(국제무역 3) 이윤정(국제무역3)

아래 조낙현(경제학 3), 신호준(경제학 3), 곽성원(경제학 3),

신호준(부경경제 3): 이전에는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인성을 보지 않다가 갑자기 인성문제가 화두가 되어 인성평가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스펙 중심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일정시간의 봉사를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올린 SNS 의 글에서 '이건 꿀자봉이다 놀다가 8 시간 봉사 받았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은 스펙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채우는 활동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스펙을 보고 채용했던 기업들은 뽑고 난 뒤,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인성을 보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기업의 인성평가 채용방식이 효율이 있을까요? 저는 다 큰 대학생들이 이제 와서 취업을 위한 인성을 기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으로부터 변화된 분위기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여서 국영수를 중시했으나, 이제는 인성이 좋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되어 국영수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아닌 인성교육이 잘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민정(동아국무 3): 네 여러분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회의 환경과 분위기는 변화하였으나 과거부터 해오던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는 변화되지 않았고 인성교육은 부족하다고 하였네요. 또 입시위주의 획일화 된 교육은 청년들의 획일화된 스펙으로 이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청년들의 스펙은 기업에 입사 후 도움이 되지 않다고 하였네요.

이제 와서 청년들이 인성을 기르는 것은 힘들지만 기업의 채용방식의 변화는 교육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이제는 국영수만 중시하는 획일화된 입시교육 위주가 아닌 인성이 중시되는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 된다는 것이네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의견에 공감됩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취업준비에 있어 인성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성평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왼쪽부터 곽성원(경제학 3), 신호준(경제학 3), 조낙현(경제학3)

신호준(부경경제 3): 인성이라는 것이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에 될까요? 남자들의 경우 취업 취업시기가 평균 26~28 살 정도 됩니다. 26~28 년 살아온 인생이 몇 개월 준비한다고 안됩니다. 아직까지는 취업에서 인성만 보고 뽑는 비율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은 늦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가정교육은 자기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기심도 가르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는 경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책은 자신이 존경할만한 사람들이 쓴 좋은 말들을 읽을 수 있어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 스스로 자신의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동도 좋지만 책 읽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정(동아국무 3): 네 저는 신호준 학우님이 하신 말씀 중 대학생들은 단기간에 인성이 바뀌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생들이 기업의 인성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다양한 대외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어느 정도의 교훈이나 경험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는 아니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인성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낙현(부경경제 3): 취업하신 선배님들이 인성이 모두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취업하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 취업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토론처럼 다른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내 생각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 저것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정성을 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무언가를 할 때 대충대충 시간 때우듯이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취업의 관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조금이나마 성장하고 우리는 기업들이 바라는 인성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베이지 않을까요?

이지현(동아국무 3): 네 조낙현 학우님의 의견처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은 낙후된 마을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벽화를 그렸고, 이 마을이 벽화마을로 유명해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마을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우리가 재능기부를 통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며 인성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조낙현(부경경제 3): 네, 이지현 학우님의 의견을 들으니 소상공인프로그램이 떠오릅니다. 대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수익이 낮은 가게 사업자들을 도와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체험인데요. 이러한 활동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윤정(동아국무 3): 음, 소상공인프로그램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만, 몇몇의 경우 소상공인프로그램 지원금으로 그냥 회식을 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를 한다거나 제대로 된 방침을 세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곽성원(부경경제 3): 신호준님 학우님의 말씀, 단기간에 인성을 기르기 힘들다. 이윤정 학우님의 말씀, 단기간에 인성을 기르는 것은 힘들지만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 모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이, 이미 어른이 되고 가치관이 형성된 우리에게는 조금 일회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에게 '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너는 이런 체험을 해라' 보다는 조낙현 학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흥미를 알아야 창의성, 인성 등을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호준(부경경제 3): 조낙현 학우님이 말씀하신 진정성, 진정성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도 즐거운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위한 인성준비를 진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왼쪽부터 이지현(국제무역 3) 이윤정(국제무역3)

이지현(동아국무 3): 제가 인성이라는 단어를 찾아 보았습니다. 인성이라는 의미에는 개성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인이기 때문에 성격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남들과 다른 자신의 개성을 키우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원하는 분야에서 직장체험을 한다거나, 다양한 경험들도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개성을 키우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아예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래도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정(동아국무 3):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인성교육문제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문제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었던 의견들도 훗날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성교육은 정부의 제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성인 된 우리가 단기간에 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도 다양한 활동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가 대립되었는데요. 기업의 채용의 변화가 우리 인성교육을 변화시켜 사회를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동아대, 부경대 학우님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⑭ 부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수창(부산신방 4): 다들 각자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2 년 전에 있었던 '지하철 막말 남' 사건을 기억하실련지요?

지난 2011 년 6 월에 지하철 1 호선에서 어떤 20 대 청년이 80 대 할아버지에게 잔소리 한 번 했다는 이유로 막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그를 말리는 다른 60 대 할아버지에게까지도 막말을 서슴지 않아 이슈화된 사건이지요.

또 2009 년에는 부산의 모 여고 수학여행에서 한 학생이 학우들에게 얼굴이 터지도록 구타당하고 나서 12 층에서 강제로 떨어져 억울하게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그것을 일으키는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은 '인성 교육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나라 '인성 교육'의 실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나요?

임성호 (부산화공 2):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인성교육이 중요시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성교육이 사회적 범죄자, 특히 싸이코 패스와 같은 사람들의 출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일단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도덕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기업 경영자 또한 도덕적으로 해이한 점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 2008 년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증권회사로부터 시작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CEO 들 보너스를 주었다는 것이 그것이지요.

이런 행태들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치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교육 장려 지원금을 악용해서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지요.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이제는 한국 사회 자체가 다원화되는 만큼 다문화 가정 또한 늘어났습니다. 국제 결혼의 증가로 베트남, 필리핀 등지의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도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과 따돌림 현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점으로 보았을 때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한 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또한 인성교육의 부재에 기인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계시는군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서혁진 (남해인정 1):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여덟 살 이후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를 통한 인성 함양 또한 중요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성 함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정서적인 교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는데 이러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성 교육의 부재'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바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부재'에 크게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국 (목포식영 3): 저는 일단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21 세기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들에 대한 교육은 유년기에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받은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공부만 잘하면 학생이 다른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단지 타이르기만 하지 말고 학생이 조금이라도 삐딱한 모습을 보인다면 처음부터 잘 잡아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는 반면 밖에 나가면 부모님의 감시의 부재로 인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담임 교사를 통한 엄격한 인성 및, 예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세 분 모두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이번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인성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계발 활동을 통한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 공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치닫다 보니 그나마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격일제나 전일제와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이나마 계발 활동을 했었는데 특히 제가 고등학교 3 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대학입시에 집중하라고 실제로 하지도 않은 계발활동을 생활기록부에 적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 내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계발 활동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실제로 계발 활동을 하다 보면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성 함양과 동시에 인성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의 '계발 활동을 통한 인성 교육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호 (부산화공 2): 가정 교육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맞벌이가 보편화된 사회이고 부모님이 늦게 귀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은 아이들이 많으면 학원을 3~4 개씩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원까지 마치다 보면 저녁 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한 가구당 자녀수가 적어서 보통 형제자매가 없이 외동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뜩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것도 모자라 학원까지 여러 개 다니다 보면 친구들과 여가 시간도 같이 보낼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유아기 때, 초등학교 때 계발활동을 통해서 잦은 교우관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는 것도 우리 나이 때 쯤이면 좀 꺼려지는 데 반하여 어린아이들은 장애인이라는 존재를 크게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 관념이 우리 나이보다는 좀 덜한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아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는 나이 때 경험을 쌓아 두면 나중에 자라서도 계기가 되면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돕는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할 때 부정적이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의 자세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혁진 (남해인정 1): 물론 계발활동을 하면서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친목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이나 문제 있는 아이들을 보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방치하고 자녀들을 관리하지 않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어 편부모거나 이혼을 했거나 양부모 자녀이거나 따뜻한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한 증오심도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반사회적인 성향을 띨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될 대로 되라 내가 착하게 살아 봤자 달라질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보듬어 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자녀들이 탈선의 길로 빠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강아지도 집에서 제대로 키운 강아지들은 겉으로 보면 깨끗하고 들강아지는 더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의 인성 교육보다는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김민국 (목포식영 3): 학교에서의 계발활동은 인성교육 함양에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에는 저 또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계발활동이 방과 후에 이루어지기에 친한 친구들끼리만 어울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편가르기 현상이 일어나 서로를 욕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인성이나 그런 것들을 잘 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친한 친구들끼리만 하면 아이들은 어디로 튈 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싸우거나 더 삐딱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 담당 선생님이나 클럽 활동 담당 선생님이 정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고 지켜봐주는 것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한 마디로 계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네요. 두 번째 방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성 교육 하면 '지리산 청학동' 같은 청소년 예절 캠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청학동 캠프를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수양 하고 예절 자세 같은 거 제대로 못한다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이 많이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저 또한 저의 행동이 상대 어른에게 잘못한 행동인 줄 몰랐는데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잘못된 것이어서 상당히 크게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인성이나 무엇이 예절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지금도 많은데 이렇듯 인성 교육에 있어서 '청학동'과 같은 청소년 예절 캠프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임성호 (부산화공 2): 어느 정도 강압적이거나 주입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아기,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는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압적인 매뉴얼은 고등학교 2 학년 선에서 끝내고 그 뒤부터는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혁진 (남해인정 1): 저도 청학동이랑 유사한 '템플 스테이'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새벽 네 시 반에 기상해서 아침을 먹은 날은 점심 겸 저녁을 먹고 브런치를 먹은 날은 저녁만 먹는 식으로 하루 두 끼 식사만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절만 하다가 밤 열 시에 취침하는 방식으로 4 박 5 일 동안 진행되는 일정이었습니다.

확실히 '템플 스테이'를 그 직후 얼마 동안은 자신이 마음만 단단히 먹고 확고한 의지를 가진다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나면 약효가 다 됩니다. 자기가 마음먹고 계속 수련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전의 일상 속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는 것이랑 마찬가집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예절 캠프를 갔다 오면 효과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종국에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신수양이나 인품 함양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기가 돈독히 마음먹고 행실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임성호 (부산화공 2): 간단히 말해 '내재화'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서혁진 (남해인정 1): 네, 그렇습니다.

김민국 (목포식영 3): 저는 청소년 예절 캠프를 진행하되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보내도록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배우고 싶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야 합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의지가 없다면 서혁진 학우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니까 배우려고 하는 의지는 더 강합니다. 하지만 커서는 이러한 청소년 예절 캠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주관이 이미 다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강제 주입식의 청소년 예절 캠프의 효과는 어릴 적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초기에 자신이 진정으로 인성 교육을 통해 변화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제시한 두 가지 방안 말고도 여러분들이 제일 좋다는 인성 교육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임성호 (부산화공 2): 시기별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기 때는 매뉴얼적인 예절 교육을 엄격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허물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사회인으로 준비하는 시기이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과정이기에 상황 별로 지켜야 할 예절 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학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공간이고 자율성이 없는 공간입니다. 사회적으로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상담사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수요일은 패밀리데이로 지정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입시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게 교육의 큰 방향입니다.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따라갑니다. 입학 사정관제를 할 때도 자기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혁진 (남해인정 1): 아무래도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소외되거나 사회에서 관심받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손길을 뻗치는 것입니다. 싹이 자라는 데 시들어서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든 것을 그 전에 싹을 잘라버리고 시들지 않고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 고등학생쯤 되면 머리도 크고 어른이 되기 전 단계의 과정입니다. 그 단계에서 고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썩은 열매를 맺기 전에 썩지 않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 하는 과정이 사회가 앞장서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민국 (목포식영 3): 인성이란 가정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주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냐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결혼 전에는 맞벌이를 많이 하다가도

일부 애 낳고 나서 가정 교육 때문에 한 사람이 그만두는 방식이 많습니다. 아이의 인성은 엄마가 봐야 된다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인성 교육을 제 때 못 받으면 커서도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러 가고 엄마가 가정을 돌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정말 너무나도 바쁘더라도 아이들의 인성 교육만큼은 부모님이, 특히 인성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년기 때 인성이 다 길러집니다. 어릴 대 착한 애들은 커서도 착하고 말괄량이는 커서도 말괄량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오늘은 '인성교육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남 지역의 다양한 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던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내 주신 작은 의견, 작은 의식의 변화가 우리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긴 시간 수고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2013 년 9 월 21 일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⑮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미란(일본학과 4) 박윤지(정치외교학과 4) 박유정(교육학과 4)

김한결(일본학과 4): 강원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문제는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인성교육 부재로 사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인성교육이 무엇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윤지(정치외교학과 4): 저는 '밥상머리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다 보니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아이들이 수저를 든다. 혹은 소리 내어 음식을 먹지 않는다 등 어른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에 인성교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가치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어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부족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인성교육 이라는 것은 어른과 아이의 위 아래, 불평등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최근의 가정 환경은 어른과 아이가 동등한 입장이 된, 혹은 아이들이 더 대접을 받는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저만 하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어른들과의 예의범절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개개인의 생활이 중요해지면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박유정 학생은 가정에서 식구들과 자주 식사를 하나요?

박유정(교육학과 4):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일찍 일어나 아침식사를 함께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일부러라도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 조차도 내가 먼저 수저를 들고 하는 등의 밥상머리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는 예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란(일본학과 4): 아이를 적게 낳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방학동한 조카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 놀이방을 많이 가봤는데요. 저희 조카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난감이라도 함께 가지고 논다든지 어릴 때부터 서로를 배려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자란 아이들의 경우 그런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가 없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 자기 물건이 아니지만 '내거다' 라는 인식이 강해, 배려를 못 배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박유정(교육학과 4): 제가 교생실습을 하면서 느낀 것은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학생들이 엇나갔을 경우 학교에서 그것을 이끌고, 혼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이 아닌 공부만 가르치고, 학생들에게는 생활지도를 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런 선생님들에게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존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학교 2013'이라는 드라마에서 선생님은 학생에게 간섭하려고 하지 않고 수업만을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라는 의미가 본래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생활태도를 배워야 하는 곳인데 어느 때부터 학교가 학원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윤지(정치외교학과 4):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전교 1 등 하던 친구가 있었지만 사실 인성의 측면에서는 착하고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성교육이 안되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딱 그런 친구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라는 말이 귀에 배어있어서 선생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1 등 하는 친구는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을 무시하고, 다른 학생들도 1 등 학생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단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눈감아 주거나 했는데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도 문제가 많지만 성적중심의, 학교가 어느 순간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면서 인성교육이 더 뒷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미란(일본학과 4): 저희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자면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깨우지만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얘는 공부 잘하니까 괜찮아' 라면서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지 않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는 입시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입시를 활용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7 월 모의고사 언어영역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때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등의 학생들의 많은 반응이 있었는데요.

저는 고전문학 '박씨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효도하고 착한 행동을 하면 큰 상금을 받게 된다. 와 같이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 인데요. 이렇게 시험의 지문을 통한 인성교육이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박윤지(정치외교 4): 저는 솔직히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지문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인성교육이 되었다면 이미 도덕시간에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인의예지가 어렵더라도 이미 무언가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학생들에게 시험지문은 단지 시험지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지문은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은유와 비유는 무엇인지 해체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학생들이 감동을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정(교육학과 4): 교생실습을 한 학교에서 사고를 친 학생들이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논에서 논밭을 매는 봉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몸을 쓰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짜 인성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문을 통한 방법은 공부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단순히 찍기 위한 지문이 되지 않을까요? 지문은 지문일 뿐입니다. 수능시험이나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에게는 흘러가는 단순히 하나의 지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미란(일본학과 4): 순천 제일고 학생의 경우 이미 잘못을 해서 봉사를 위해 요양원에 방문한 것인데. 그곳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보면 몸으로 쓰는 봉사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엄이 없다면 교내봉사도 인성교육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지미란(일본학과 4):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받았더라도 커가면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바뀌지 않을까요?

박윤지(정치외교학과 4): 제 사촌 여동생의 경우 이모가 엄격하게 인성교육을 하여 중학교 때까지는 착한 아이였지만 고등학교에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께 대들다가 강제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런걸 보면 어릴 때부터의 인성교육도 환경에 의해서 많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어른에 대해 반발심을 갖는 이유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합니다. 어느 시기의 인성교육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들의 주관이 뚜렷해져서 그 전에 완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그러면 주제를 넘어가서, '나는 인성교육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윤지(정치외교 4): 저는 제가 처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밥상머리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핵가족화가 되어 간다든지, 가족 개인의 생활이 중요해지는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박윤지(정치외교학과 4): 가정에서 시작하는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들에게 강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먹는 밥 한끼가 작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성교육이 아이의 평생의 인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부모에게 강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교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생님 한 명에 학생 10 명.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학생과 선생님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해 인성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김한결(일본학과 4): 이른바 학교 판 밥상머리 교육 이네요. 그러고 보면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안 계시는 식당에서 학생들끼리 밥을 먹다 보면 결국 선생님 욕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 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윤지(정치외교학과 4): 처음은 학생들이 싫어하겠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인성교육에도 좋은 영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 이런 것이 학생들에게는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요.

지미란(일본학과 4): 저는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라도 상담시간을 지정하여 상담교사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아무래도 교과 선생님은 학생의 성적만 보지 않을까요?



김한결(일본학과 4): 학생들의 사정과 이야기를 안다면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한 성적으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사정과 함께 생활태도에도 관심을 갖고 간섭해 주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유정(교육학과 4): 저는 선생님에게도 인성교육 방법을 배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상담교사는 따로 뽑지 않기 때문에 상담교사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에 하는 연수기간을 통해서 인성교육 방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인프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학생들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지(정치외교학과 4): 어른들의 인성교육도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버스를 타면서 학생들에게는 자리를 비키라고 호통을 치지만, 정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버스를 타면 자리를 비켜드리지 않는 어른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와 학생이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랄 것입니다. 자신들은 존경하지 않으면서 존경 받으려고 하는 어른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인성교육도 필요하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인성교육 문제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공부를 잘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의 인성교육이 우선시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입니다.

⑯ 울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정혜진(경찰3), 정주아(법학4), 최정은(정외3), 최해정(경제4), 차은지(법학4) .

최정은(정외 3): 지금부터 한국선진화 포럼 제 77 차 월례토론회 '인성교육,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의 주제를 통해 울산대학교 학생들과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학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울산대학교 학우들과의 선진화 연구모임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신 한국선진화포럼에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선진화 연구모임은 한국선진화포럼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월례토론회의 주제에 관하여 12 기 홍보대사인 제가 쓴 칼럼내용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해 보는 시간인데요. 연구모임을 하기에 앞서 제 칼럼과 발제문 나눠드린 것을 읽어 보셨을 거예요.

이번 제 77 차 월례 토론회의 주제인 '인성교육,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에 대해 제 칼럼은 인성교육의 해답으로 거론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써 보았습니다.

요즘, 인성교육문제가 한국사회문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인성교육의 문제에 대해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칼럼을 토대로, 인성교육의 해답으로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입학사정관제 이외에도 인성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국의 인성교육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정주아 학생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아(법학 4): 현재 한국의 인성교육은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학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멘토링 활동을 했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선생님을 대하는 중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한번씩 놀랄 때가 많았어요.

우리도 솔직히 그렇게 인성교육을 잘 받았다곤 생각하지 않는데 더 버릇없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다 민망해지더라고요.

최해정(경제 4):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한대 쥐어박고 싶을 정도로 버릇없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어른들이 볼 땐 저희도 버릇없이 보일 때가 많을 거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못인 것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시 하는 경향이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맞아 가면서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배운 것 같은데 요즘 청소년들은 워낙 집에서 부모들이 끼고 키우니까 버릇없는 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왼쪽부터 정혜진(경찰3), 정주아(법학4), 최해정(경제4), 차은지(법학4) .

정혜진(경찰 4): 그래서 저는 진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사랑의 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에는 자식들을 너무 오냐 오냐 키우는 게 문제잖아요. 인성교육은 가정교육의 문제인데, 요새 애들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요.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부모 욕 먹는 일인데요 뭘.

차은지(법학 4):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창피하기도 한 게 솔직히 우리들,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요즘 젊은이라면 젊은이인데 주변을 돌아봐도, 자기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게 올바른 인성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싶네요. 우리도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최정은(정외 3): 차은지 학우님의 말을 들어보니 인성교육 문제의 실태가 그리 먼 곳에 있는 것 같지 않네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게 굳이 청소년의 인성문제라고 한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더라도 20 대의 인성문제로 인한 사건사고도 비일비재하니까요. 스스로 자기자신을 되돌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아(법학 4):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20 대 아들이 집을 나가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걱정을 하셨나 봐요. 근데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나 봐요. 근데 아버지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돈이 될만한 것을 처분하고 그랬대요. 그런 것만 봐도 인성교육문제가 시급하다고 봐요.

최정은(정외 3):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성교육문제의 해답으로 입학사정관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제 칼럼을 보셨듯이 저의 생각은 과연 입학사정관제의 시행이 인성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차은지(법학 4): 저도 연구모임을 한다고 해서 좀 알아보긴 했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 벌써 입시를 잊고 산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우리 때랑 입시가 많이 달라졌더라구요. 입학사정관제 말은 들어봤지만 뭔지는 잘 몰랐거든요.

입학사정관제가 수능이나 학생부가 아닌 다른 이런저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시제도라고 들었어요. 근데 입학사정관제가 제일 처음 미국의 종합평가제도에서 전해온 거래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전해져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따른 득과 실이 공존하긴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는 뭐라 할까, 한국사회에선 아직 이른 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우리사회 내에서는 공정하게 눈에 보이는 절차가 없이는 비리가 만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크잖아요? 그런 제도로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한다는 게 저도 한국사람이라 그런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부터 들더라고요.

정혜진(경찰 3): 차은지 학우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솔직히 인성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평가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어떻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교수들이 도사도 아니고 면접을 통해서 어떻게 처음 보는 학생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성이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도 아닌데 인성에 교육이라는 말을 붙여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하나의 과제로 인식시키는 것 같아요.

최해정(경제 4): 참, 다 큰 학생들에게 인성을 따로 교육시키는 것도, 또 그걸 평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현재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고 해도 인성교육이란 것은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쩌면 필수적인 덕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이미, 십 몇 년을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와 놓고 이제 와서 공동체 사회를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인성을 다시 교육시킨다는 것은 주객전도가 아닌가 해요. 근데 입학사정관제는 입시제도 아니에요? 우리 대학갈 때 인성도 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최정은(정외 3): 과연…



왼쪽부터 정혜진(경찰3), 정주아(법학4), 최정은(정외3), 최해정(경제4), 차은지(법학4) .

정주아(법학 4): 그러게요. 우리 때 인성평가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걸. 인성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입시제도에 반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든 고 3 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과연 봉사활동이나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가 아닌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는 좀 더 생각 좀 해볼게요. 사회자께서는 뭐 생각해 본 것 없나요? 먼저 얘기해주세요.

최정은(정외 3): 그냥 이야기 하시지… 저는 사회만 보려고 했는데…… 저에게도 질문이 왔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입학사정관제가 딱히 해결방안이 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음, 저도 알아봤는데 인성교육에 대한 다른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기 이전에 저는 다른 국가의 인성교육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인성교육이 창의성과 시민교육이 함께 실시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존경, 정의, 공평, 배려처럼 윤리적인 덕목뿐만 아니라 다양성, 책임, 신뢰와 같은 시민덕목도 강조하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데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에서 시행시키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 접목시켰다고 하면 우리는 뭐 도덕수업이나 윤리과목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역사나 사회과목에서는 윤리적인 가치를 찾게 하고 문학과목에서는 도덕적 딜레마에 초점을 맞춰서 에세이를 쓰게 하고 수학과목에서는 도덕적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친대요.

또 토론 모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의 인성교육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해정(경제 4): 음.. 미국의 인성교육은 토론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교육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도 발표수업 같은 거 하기 꺼려하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온 주입식 교육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최정은 학우도 지난 학기에 발표수업 안 들으려고 거의 골라 들었잖아요…

최정은(정외 3): 아.. 네 그렇죠..그런 얘기까지 하시네요.

최해정(경제 4): 뭐 저도 물론 발표수업이나 토론수업을 엄청 싫어하지만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고치려면 미국의 인성교육 방법도 좋은 교육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교육을 역사나 문학수업에 접목시켜 생각한 게 참신하고 본받을 만 한 것 같아요!

정혜진(경찰 3): 저도 그래서 인성교육평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우리 요새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식신원정대같은. 미스터리 쇼퍼라고 미리 신분을 숨긴 채 맛집을 방문해서 맛이나 서비스, 분위기, 위생, 청결 이런 것을 미리 평가해서 평균점수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떠오른 건데, 음 초등학교 1 학년? 은 너무 어리겠고 뭐 2 학년이나 3 학년부터 고 3 까지면 근 11 년 정도 거든요. 한 학기당 2 번씩 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미스터리 캐릭터? 미스터리 퍼스널리티? 활동을 업무에 추가시키는 거에요.

미스터리 퍼스널리티는 그냥 제가 이름 붙여 본거 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교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남처럼 신분을 숨긴 채 길을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랬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나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죠.

솔직히 인성자체가 자연스럽게 몸에 베여있는 습관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진짜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해요.



왼쪽부터 정혜진(경찰3), 정주아(법학4), 최해정(경제4), 차은지(법학4) .

최정은(정외 3): 공부 엄청 많이 하고 오셨네요.

정혜진(경찰 3): 당연하죠!

차은지(법학 4):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면 학생들이 누군지 다 알지 않을까요? 변장을 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요새 애들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다 알 것 같은데.

최정은(정외 3):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혜진(경찰 3): 아니 아니. 같은 학교 선생님들이 하면 안되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그러면 공정하지가 못하잖아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알면 공정한 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 소속의 선생님들이 시, 도를 바꿔가면서 평가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지는 건가? 뭐 너무 크다면 동이나 구단위로 교사들이 바꿔가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냥 뭐 예를 들면 지나가는 행인이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을 한 채 짐을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1 년 년간 3~4 회 정도의 평가가 11 년이나 누적된다면 장기적인 평가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공정한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최정은(정외 3):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리를 통해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일도 없고 언제 어디에서 평가가 이루어질지 모르니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항상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점수니까. 그러면 아이들도 일부러라도 의식하여 바르게 행동할 것 같아요.

정주아(법학 4): 아 저는 정혜진 학우님이 말씀하신 미스터리캐릭터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교육부나 청와대에 메일 한 통 보내실 생각 없으세요?

정혜진(경찰 3): 아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정주아 학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메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주아(법학 4): 아니,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아까워서 그래요. 진짜 인성은 자연스럽게 몸에 베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시행착오나 그런걸 겪으면서, 잘못을 하고 혼나가면서 배워야 하는데 요새는 잘못을 해도 혼내는 사람도 없고, 선생님들도 혼내는 걸 잘 못하는 편이잖아요.

최정은(정외 3): 그렇죠. 학생이 더 무섭잖아요.



왼쪽부터 정혜진(경찰3), 정주아(법학4), 최해정(경제4), 차은지(법학4).

정주아(법학 4): 네 그래서 오히려 남보다 자기자신을 더 생각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최정은 학우님 저번 칼럼을 보니까 바른말 암행어사제도가 있더라고요. 읽으면서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초등학교 저학년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멘토링 해보니까 애들이 진짜 어려요.. 감당 안될 만큼.. 그래서 초등학교 1~3 학년 까지는 바른말 암행어사처럼 그런 제도를 시행해서 평가 겸 몸에 베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아까 정혜진 학우님이 말씀하신 미스터리 캐릭터제도 그거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은지(법학 4): 미스터리 캐릭터 방안을 시행하면 교사들에게도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인성교육문제가 인성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나 부모의 역할 부재에서 오는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사나 부모조차도 인성이 먼저가 아니고 성적이 먼저라고 아이들을 다그치니까 인성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구요. 아까 정혜진 학우님이 말씀하신 미스터리 캐릭터? 방안을 통해서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에게 인성교육의 책임자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 같아요.

엄연히 교육평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 실시될 지 모르는 미스터리 평가를 대비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인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게 될 것 같아요.

최정은(정외 3): 네, 여러분의 의견 잘 들어 보았습니다. 제 칼럼에서 나온 바른말 암행어사와 정혜진 학우님의 '미스터리 캐릭터', 그리고 미국의 인성교육 방안까지 따온다면 한국의 인성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의 인성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덧붙여 말해보자면, 교육의 문제가 큰 것 같거든요. 자타가 공인하는 똑똑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입식 교육에 얽매여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지향주의, 학력지향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되어가다 보니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점점 더 줄어들고 개인주의 성향이 확산되어 공동체 사회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거죠.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서 발표하는 게 싫긴 하지만 토론식 교육이나 자신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확산해 간다면 평가에 대한 폭도 넓어질 것이고 아이들이 학업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주아(법학 4): 아니요. 음.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최정은(정외 3): 어떤 면에서?

정주아(법학 4): 선진국의 교육시스템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아직 인성문제도 그렇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최정은(정외 3): 다른 분들은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혜진(경찰 3): 저도 약간,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 개발도상국보단 나은 것 같은데, 복지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선진국이라고 보기엔 아직 힘든 것 같아요.



왼쪽부터 정혜진(경찰3), 정주아(법학4), 최정은(정외3), 최해정(경제4), 차은지(법학4) .

최정은(정외 3): 네.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나라였잖아요. 전쟁 이후에,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낸 국가인데, 어느 나라를 봐도 전례가 없는 국가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토론한 인성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정신적 가치인 인성을 등한시하며 성장하였고 그렇게 나라를 경제적으로 우수한 국가로 올려놓고 보니 이제서야 우리가 놓치고 온 부분에서 문제가 하나씩 터지는 것 같아요.

나라의 품격이라고 하죠. 국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3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자본, 해외에서의 위상! 이 세 가지 중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강국이 되었고 싸이와 같은 월드스타를 배출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될 만큼 국제적 위상도 높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제일 기본이 되는 사회적 자본, 즉 정신적 가치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토의한 내용처럼 사회적 자본의 역량을 고취시킬 수 있고, 한국의 인성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저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학생 분들 모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석하여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고 뜻 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들 4 학년이신데 거의 5~6 년을 꾸준히 본 학우님들인데 이런 대화는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선진화 연구모임은 오늘을 시작으로 매달 1 회씩 12 월까지 이어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릴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화 과제 28: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제 101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권순형(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행복은 정신적 풍요로부터 옵니다!

물질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풍요를 추구함으로써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3 월 24 일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한국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고자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라는 주제로 제 101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한국의 선진화 방향은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정신 측면에서 도덕적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며 경제적으로는 절제하여, 풍요로운 문화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하 교수는 “실천방안으로 첫째, 전통적 윤리도덕의 부활과 부정부패의 척결 및 기초질서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사교육비를 축소하고 허례의식을 척결하며 음식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넷째,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문화서비스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 풍요는 선진국 수준! 그러나 정신적 풍요는 아직 멀었네요

토론자로 나선 김주성 교원대 교수는 “과거 성적 위주의 교육프레임이 바뀌지 않고는 저성장 고령화시대를 이끌어갈 후속세대를 키울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독립심이 있는 자아를 키워주고 평생 스스로 교육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의 의식개혁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삼승 영산대 석좌교수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민간분야 비리의 경우, 현행의 법체계상으로는 개인이 처벌받으면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법 태도이기에 법인 등에 대하여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를 낮추는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정부의 취약한 재분배 기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공평한 조세정의를 통한 소득배분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개혁이 정신적 풍요의 시작점 아닐까요?

어릴 때 받은 교육은 한 개인의 평생 가치관을 좌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주성 교수가 성적만 강조하는 교육으로는 변화하는 21 세기에 적응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매우 공감되었습니다. 아울러 김용하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높은 사교육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왜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해서 잘 모른 채 ‘남들이 하니까’ 무작정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교육을 받아 취업하는 것인데, 무의미한 무한경쟁 교육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따라잡기 고도 성장전략을 구사했던 과거에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식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컸습니다. 왜 배우는지는 몰라도 열심히만 하면 물질적인 생활수준이 빠르게 나아졌습니다. 배를 곪지 않게 되고, 나만의 차를 가지게 되고, 내 집을 소유하게 되면서 행복은 물질적 풍요를 통해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릅니다. 획일적이고 단순한 지식암기가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통한 ‘창조’가 필요합니다. 1 인당 GDP 가 2 만 달러를 넘어서면 물질적 개선이 행복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의식, 신뢰, 청렴, 도덕, 문화 등 정성적인 요인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은 만성적 저성장, 경기순환 약화,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특징인 뉴노멀 시대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으로 모두가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조금 개선되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함께 크게 무너집니다. 인공지능 중심의 4 차 산업혁명으로 창의적인 인재만 살아남고 다른 일자리는 크게 줄어듭니다. 다품종소량생산의 확산으로 개성이 없고 감성을 자극할 수 없는 상품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에 대비한 백년대계의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OECD 1 위의 사교육비 지출, 70% 초반의 대학진학률로 대표되는 성적지향 무한경쟁으로는 뉴노멀, 글로벌리제이션, 4 차 산업혁명, 다품종소량생산 시대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 공부해야 합니다. 학문에 뜻이 있는 학생들만 대학에 진학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키워주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교육은 빨리빨리 성과를 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장거리 경주에 대비해야 합니다.


독일의 도제 시스템은 전문 산업 인력을 양성합니다

먼저 대대적으로 직업학교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문화가 심화되어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문에 뜻이 없는데 대학에 진학하는 건 낭비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 수준에서 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고등학교 졸업 후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도제시스템이 있습니다. 도제시스템을 통해

양성된 전문 산업 인력은 대학졸업자보다 취업이 쉽고 그들 못지않은 연봉을 받습니다. 덕분에 독일은 대학진학률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실대학이 많습니다. 점차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부실화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대학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학교로 개편한다면, 대학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등교육제도를 개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직업학교는 평생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경쟁, 빠른 기술혁신, 다품종소량생산으로 인해 산업구조는 유례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깁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평생교육을 통해 구 직업의 몰락과 신 직업의 탄생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초중고 교육현장에서는 성적 중심의 경쟁은 지양하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독서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도 자주 가져야 합니다.

복지 시스템의 확충도 중요합니다.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장거리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을 하는 이면에는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의 큰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복지를 통한 적절한 소득재분배를 이루어 임금격차를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뉴노멀, 글로벌리제이션, 4 차 산업혁명, 다품종소량생산의 새로운 시대에 성적 중심의 무한경쟁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적성과 흥미를 찾아주는 교육이 성공하는 길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단거리 경주보다 장거리 경주에 강한 인재를 길러내야 할 때입니다!

사진 4: 딴지일보

② 김주영(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3 월 24 일,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라는 주제 아래 한국선진화포럼 제 101 차 월례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고자, 물질과 함께 정신적, 내면적 풍요를 추구함으로써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발제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 교수는 "더 좋은 직장과 더 나은 소득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모두에게 불행만을 제공할 뿐"이라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물질 만능의 소비를 통한 만족 추구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사회를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윤리도덕 부활운동 전개, 부정부패 척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의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이 직접 참여해 경제 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과당경쟁의 지배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문화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사구시, 경세치용의 절제사회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교육비 축소, 허례허식 척결, 음식쓰레기 및 과음 과식 지양 등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미래 한국의 선진화 방향은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라며 "정신 측면에서 도덕적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며, 경제적으로는 절제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서로 연대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토론자로 나선 김주성 교원대 교수는 "과거 성적위주의 교육프레임이 바뀌지 않고는 저성장 고령화시대를 이끌어갈 후속세대를 키울 수 없다"면서 "독립심이 있는 자아를 키워주고 평생 동안 스스로 교육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삼승 영산대 석좌교수는 정신문화를 선진화 하는 방안으로 타협·협상·중용을 제시하면서 "교조적인 결과보다는 실용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해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를 낮추는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정부의 취약한 재분배 기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와 과세공평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롭지만, 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신적으로 병들어갈까요? 그간 '성장제일주의'라는 기치 아래, 우리는 전통 윤리가 단절된 상황에서 앞으로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 발전은 어느 정도 이룩했지만, 사회갈등해소를 위해 쓰이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고민하는 것이 선진국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오늘날 정신적 토대를 우리의 전통에서 찾자.

개인의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하듯, 우리 사회 역시 진리로 여길 정신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전통윤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통윤리와 생활가치는 포용적 조화사상에 근거한 공동체 의식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 원광법사의 세속 5 계, 원효대사의 화쟁사상, 의상대사의 화엄사상, 최치원의 유불선 3 교 1 체, 유교의 오륜사상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전통윤리의 대대적인 부활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역사 교육과 사회 공헌 활동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머지않아 젊은 세대들이 현대 한국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성장과 저출산 그리고 분배의 양극화 늪에 빠져 시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희망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살피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③ 김주헌(영남대학교 국사학과)



지난 3 월 24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저출산·고령화·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고자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제하의 제 101 차 월례토론회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 교수는 "더 좋은 직장과 더 나은 소득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모두에게 불행만을 제공할 뿐"이라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물질 만능의 소비를 통한 만족 추구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 윤리도덕 부활운동 전개, 부정부패 척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래 한국의 선진화 방향은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또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이 직접 참여해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교수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과당경쟁의 지배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문화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사구시, 경세치용의 절제사회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교육비 축소, 허례허식 척결, 음식쓰레기 및 과음 과식 지양 등의 3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래 한국의 선진화 방향은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라며 "정신측면에서 도덕적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며, 경제적으로는 절제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마무리 했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자!

이밖에 토론자로 나선 김주성 교원대 교수는 "과거 성적위주의 교육프레임이 바뀌지 않고는 저성장 고령화시대를 이끌어갈 후속세대를 키울 수 없다."면서 "독립심이 있는 자아를 키워주고 평생 동안 스스로 교육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양삼승 영산대 석좌교수는 정신문화를 선진화하는 방안으로 타협·협상·중용을 제시하면서 "교조적인 결과보다는 실용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를 낮추는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정부의 취약한 재분배 기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덧붙여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와 과세공평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풍요속의 빈곤을 맞이한 우리, 재충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성장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정신적인 삶의 피폐화'가 찾아오게 된 상황입니다. 즉, '풍요 속의 빈곤'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안정과 풍요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러한 풍요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문명을 최고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정신적인 풍요를 기반을 최우선시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잦은 야근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으며 체력을 재충전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2016 년 3 월 23 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약 50%가 '주 3 회 이상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무가 많아서 야근을 하기도 했지만 무언중에 야근을 독려하는 회사의 문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풍요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혁신적 기업문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업문화는 조직을 보다 창조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났습니다. 조직이 관료화 되고 일 처리가 정형화되면서 일을 위한 기계로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정신적 풍요를 위해 서로 '배려하는 삶'이 필요하다

기업문화가 이렇게 정체된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비롯하여 국가적인 경쟁력을 깎아먹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이 나서서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내부개조(renovation)를 해야 할 때이며, 국가차원에서도 이러한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 기업주들이 직장인들에 대해 조금씩 배려를 한다면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으로서 효율성이 올라가고 기업의 이윤 등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여가생활로 인한 소비의 촉진으로 국가의 경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사진 4 : http://diarix.tistory.com/215

④ 김한슬(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착한 성장 위해서는 '물질'보다 '정신적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물질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풍요를 추구함으로써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한국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고자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제목 하의 101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 교수는 "더 좋은 직장과 더 나은 소득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모두에게 불행만을 제공할 뿐"이라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물질 만능의 소비를 통한 만족 추구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문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1)전통적 윤리도덕 부활운동 전개 (2)부정부패 척결 (3)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 특히 정부가 직접 참여해 경제 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과당경쟁의 지배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문화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사구시, 경세치용의 절제사회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1)사교육비 축소 (2)허례허식 척결 (3)음식쓰레기 및 과음 과식 지양 등의 3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래 한국의 선진화 방향은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라며 "정신 측면에서 도덕적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며, 경제적으로는 절제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이밖에 토론자로 나선 양삼승 영산대 석좌교수는 정신문화를 선진화 하는 방안으로 타협, 협상, 중용을 제시하면서 "교조적인 결과보다는 실용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해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를 낮추는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정부의 취약한 재분배 기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와 과세공평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주성 교원대 교수는 "과거 성적위주의 교육프레임이 바뀌지 않고는 저성장 고령화시대를 이끌어갈 후속세대를 키울 수 없다"면서 "독립심이 있는 자아를 키워주고 평생 동안 스스로 교육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오늘날과 같은 뉴노멀시대,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단거리 경주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장거리 경주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은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달리다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서 또 달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 시절처럼 똑같은 패턴의 인간을 찍어내는 오늘의 우리의 교육제도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야하는 백년대계이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교육이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기르는 것이므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까지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어떠한가요?

우리나라의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잘 하는 것을 생각해볼 틈도 없이 수업을 듣고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다. 새벽이슬을 맞으며 학교에 나와 밤이슬을 맞으며 집에 돌아가고, 방학은 길어야 1 주정도, 나머지 방학기간 동안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합니다.

공부에 적성이 맞고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대학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다른 분야에 소질이 있다면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대졸자와 고졸 혹은 중졸자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부터가 다르고 취업에 있어서도 불리하고 차별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너도나도, 학문에 뜻이 있건 없건 대학을 가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공부해야 합니다.



수능 성적 비관 자살은 매년 들려오는 소식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매년 수능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자신의 수능성적을 비관한 고등학생의 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반문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의 인구 추세라면 2023 년에는 약 200 개의 대학이 입학정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할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약 7년 뒤면 입학정원 미달 대학이 속출할 전망이다.

위의 표를 보시면, 2020 년 만 18 세 인구는 약 50 만 명이지만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약 56 만 명)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모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6 만 명의 정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가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소위 부실 대학의 수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특히나 부실 대학의 퇴출은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그 근거를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이는 당장의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 추세를 반영했을 때 꼭 필요한 개혁이며, 장기적으로 대학이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사람을 대학 타이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력과 노력으로 평가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교육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적 가치인 부와 명예, 재산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정신적으로 풍요롭지 않다면, 그보다 돈이 적더라도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의 삶보다 행복함을 적게 느낄 것입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해서 노력한다면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도 결국은 이러한 행복 아닐까요?

모두에게 획일화된 교육을 통해 오로지 '대학'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며,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불안감이나 위축 없이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magazine.hankyung.com
4: imnews.imbc.com
5: economy.hankooki.com
6: happyedu.moe.go.kr

⑤ 김효원(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정신적, 내면적 풍요를 추구하고 착한 선진화 이룩하자!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현시점에서 윤리·도덕의 붕괴로 부정부패와 가족파괴 등 아노미 현상이 만연하고,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대 간 남북 간 갈등도 증폭되고 경제도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물질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풍요를 추구함으로써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고자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101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한다.

발제자인 김용하 교수는 "한국의 선진화 방향은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정신 측면에서 도덕적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며 경제적으로는 절제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실천방안으로 “ 첫째, 전통적 윤리도덕의 부활과 부정부패의 척결 및 기초질서운동 전개. 둘째,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인프라' 구축. 셋째, 사교육비 축소와 허례의식을 척결하고 음식쓰레기를 줄이자. 넷째,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문화서비스 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를 내세웠습니다.

토론자인 김주성 교수는 "과거 성적 위주의 교육프레임이 바뀌지 않고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이끌어갈 후속세대를 키울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독립심이 있는 자아를 키워주고 평생 스스로 교육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의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양삼승 교수는 "정신문화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타협, 협상, 중용 그리고 실용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민간분야 비리의 경우, 현행의 법체계상으로는 개인이 처벌받으면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법 태도이기에 법인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를 낮추는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정부의 취약한 재분배 기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와 과세공평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업비와 국방비의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문 간 재정지출의 균형을 회복하며, 사회투자의 확대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하여 재정의 사회적 생산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세체계의 누진적 보편세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보다 큰 폭으로 줄이면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행복지수 최하위권,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궁극적인 국력 증진의 목표와 선진화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 증진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적정선을 넘기면 행복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경제적 요인인 정신적 풍요를 키운다면 사회 갈등 해결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1 인당 GDP 는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 관용,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현저히 떨어지는 사회적 관계지수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헬조선'과 '흙수저'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행복도는 높은 경제수준만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덴마크, 독일과 같은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1 인당 GDP 도 일정부분 증가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지수를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도덕이 부활하여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질서 있는 도덕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렴한 대한민국, 착한 선진화의 첫걸음은 부정부패 척결!

이러한 도덕국가로서 착한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상 비리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입법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부정부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업, 정부, 기관, 학교 등의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화 시켜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실시한다면 국가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부정부패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투명도와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국민의 행복지수가 크게 높아지는 것뿐 만 아니라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도덕, 복지사회구현과 착한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⑥ 손재정(고려대학교 중국학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화, 저성장의 시대에 분배의 양극화로 치닫는 오늘날, 사회적 불안, 불만, 불신이 팽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또한 실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장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성숙된 사회, 문화적 자본을 구축하여야 하며, 윤리도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전통적 윤리도덕을 부활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복지 인프라로 공감사회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체계화하고 생애주기적 노동, 보건,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며 고용창출과 성장지향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당당히 고용될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교육문화의 지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교육프레임에 있으며 학벌주의, 암기력 위주의 성적지상주의를 타파하고 독립심 있는 강한 자아를 키워내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양삼승 변호사는 기업활동의 창의력을 최대한 보장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전제 하에 대체근로와 파견근로에 대하여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환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민간분야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엄단하기 위하여 소극적 입법태도를 지양하여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서도 처벌을 강화하여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정의의 집행, 오로지 법으로 가능합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조세정의와 과세공평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선별주의 복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정신적 풍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지도층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층에서의 변화는 파급력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이들이 변화를 시작하고 이끌어나가야만 쇄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 지역 명사들과 청소년들이 활동적으로 어울려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다수 확보하여 결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밀집하지 않고 각 지방에 고루 분산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과 노년의 화합, 한자리에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과 소통의 능력입니다. 기성 세대와 청소년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접촉의 장을 마련하고 두 세대가 치열하게 뛰어들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한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뚝 선, 존경받아 마땅한 이들은 사실 대한민국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가능성에 그칠 것인지, 현실이 될 것인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⑦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신적 풍요로 행복을 얻어야 한다

물질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풍요를 추구함으로써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3 월 24 일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고자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라는 주제로 제 101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한국의 선진화 방향은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정신 측면에서 도덕적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며 경제적으로는 절제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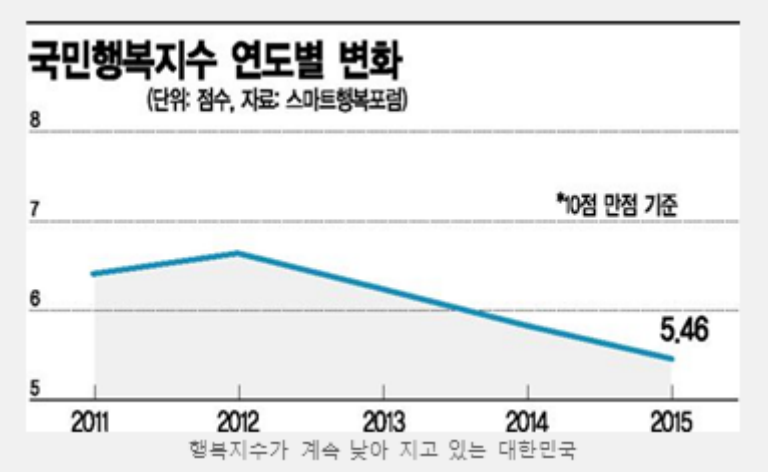
세계 행복 순위

김용하 교수는 “실천방안으로 첫째, 전통적 윤리도덕의 부활과 부정부패의 척결 및 기초질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사교육비를 축소하고 허례의식을 척결하며 음식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넷째,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문화서비스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주성 교원대 교수는 “과거 성적 위주의 교육 프레임이 바뀌지 않고는 저성장

고령화시대를 이끌어갈 후속세대를 키울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독립심이 있는 자아를 키워주고 평생 스스로 교육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의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삼승 영산대 석좌교수는 정신문화를 선진화하는 방안으로 타협·협상·중용을 제시하면서 “교조적인 결과보다는 실용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행복지수가 계속 낮아 지고 있는 대한민국

““법 제도적 측면에서 민간분야 비리의 경우, 현행의 법 체계상으로는 개인이 처벌받으면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법 태도이기에 법인 등에 대하여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를 낮추는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정부의 취약한 재분배 기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와 과세공평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 소득은 27,000$에 달합니다. 선진국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보니 국민소득이 20,000~25,000$ 정도이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미 절대 빈곤 문제는 해결한 상태입니다. 이때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가장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2013년 세계행복보고서 및 1인당 GDP

국가	세계 행복 순위	1인당 GDP 순위
덴마크	1	6
코스타리카	12	65
미국	17	9
오만	23	39
브라질	24	62
한국	41	29
일본	4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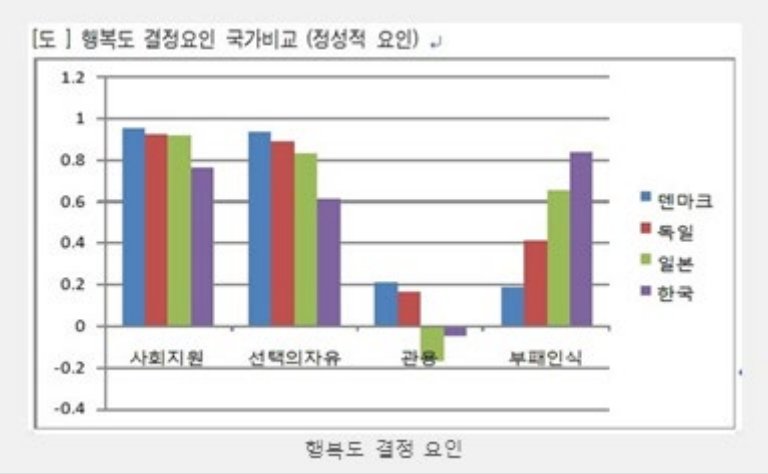
자료 : UN / IMF

행복지수와 GDP는 비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더 이상 일인당 GDP 가 올라 가 봤자 행복지수가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사회적 결정요인이 중요합니다.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제도,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척결과 같은 사회적 결정 요인들이 국민의 행복도를 높입니다.

오늘날은 글로벌리제이션시대, 국경 없는 경제 전쟁시대이며 제 4 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즉 소 품종 다량이 시대가 아니라 다 품종 소량 시대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전 세계에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성장 시대 심각한 분배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동시에 부양 정책을 쓰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동시에 경기 부양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배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사회갈등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저성장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언론들에서 관련 광고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를 통한 홍보도 활발히 벌여야 합니다.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생들이 정신적 풍요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대학들에서는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성장 시대는 우리만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물질적 풍요에서 나오는 행복은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정신적인 풍요를 누릴 줄 아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⑧ 이승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정신적 풍요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고, 그것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한 현재에는 다음 단계인 정신적 풍요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101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김용하 교수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최근에 급속도로 하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행복도" 관련 그래프를 근거로 들어, 1 인당 GDP 가 2 만 달러를 넘어서면 경제적 결정 요인보다 사회적 결정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하락하고 있는 행복지수를 다시 높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개선하려면 정신문화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도덕을 중시하고, 서로 공감할 줄 알며, 절제하고, 문화가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실천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주성 교수는 문화 제도적 변화를 위해 교육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보내기' 교육에만 매달리는 교육문화 지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학부모들이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도록 교육문화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어서 양삼승 교수는 우리나라가 과정이나 절차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문화에 치우쳐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이라는 결과보다는 현재 가진 것으로 더욱 질 높은 생활을 즐기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한 빈곤율 감소 효과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급속한 성장보다는 잘 나눠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 중요하다고 가르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것만 중요시하는 경쟁 사회

경쟁하는 사회도 좋지만,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배려와 신뢰, 그리고 공동체 질서를 잘 지키는 인재를 기를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사라져야 합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정은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직업에 대한 차별은 없애야 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심을 최소화하고 물질만능주의를 제거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강자와 약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자본주의 4.0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함으로써, 경제발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1: httpcafe.naver.comcarrymyjoy1553
2: httpblog.naver.comyeonmot1220632094258
3: httpbadventure.kr4832
4: httpblog.naver.comgldlgldlgl220609175394

⑨ 이재환(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선진화? 정신적 풍요와 함께~

물질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풍요를 추구함으로써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선진화 포럼이 저출산·고령화·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고자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 방안'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 교수는 "더 좋은 직장과 더 나은 소득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모두에게 불행만을 제공할 뿐"이라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물질 만능의 소비를 통한 만족 추구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 윤리도덕 부활 운동 전개, 부정부패 척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적정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이 직접 참여해 경제발전과 복지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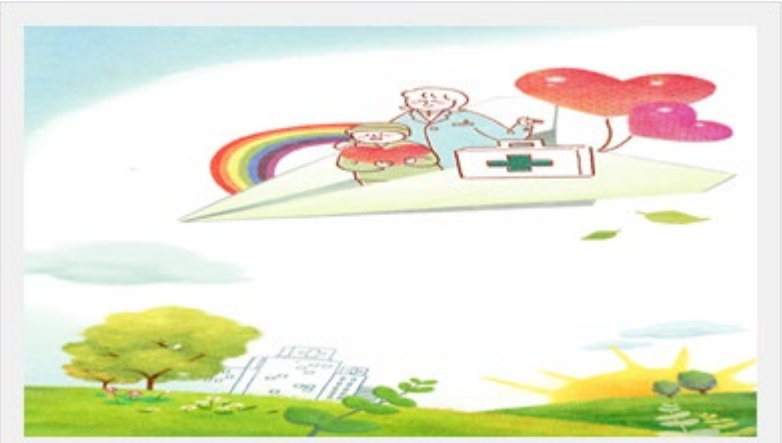
인간성 회복을 위한 복지, 선진화!

그러면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과당경쟁의 지배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문화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사구시, 경세치용의 절제사회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교육비 축소, 허례허식 척결, 음식 쓰레기 및 과음 과식 지양 등의 3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토론자로 나선 김주성 교원대 교수는 "과거 성적 위주의 교육 프레임이 바뀌지 않고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이끌어갈 후속세대를 키울 수 없다"면서 "독립심이 있는 자아를 키워주고 평생 동안 스스로 교육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양삼승 영산대 석좌교수는 정신문화를 선진화하는 방안으로 타협·협상·중용을 제시하면서 "교조적인 결과보다는 실용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를 낮추는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정부의 취약한 재분배 기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며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와 과세 공평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적위주보다는 꿈을 찾아주도록

저는 성적 위주의 교육 프레임에서 독립심 있는 자아를 키워주어야 한다는 김주성 교수님의 말씀처럼 아이들이 자신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게 해주고 그것을 한 우물 팔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향해서 자신만의 시간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의성, 자기주도적이기보다는 누군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선진화는 이루었지만 자신의 행복보다는 돈만 쫓게 되니 정신적인 풍요의 선진화와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선진화는 물질적인 풍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무엇보다 행복을 찾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아이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과 '잘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 직업탐구와 특기적성 탐구교육 시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것에 몰두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토론에 기반을 두는 수업으로 자기들의 견해와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여야 자신의 정체성도 찾게 될 것이고 행복도 찾을 것입니다!

⑩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물질보다는 내면적 정신적 선진화를 먼저 이룩해야한다

물질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풍요를 추구함으로써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3 월 24 일 저출산·고령화· 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고자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라는 주제로 제 101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한국의 선진화 방향은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정신 측면에서 도덕적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며 경제적으로는 절제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하 교수는 “실천방안으로 첫째, 전통적 윤리도덕의 부활과 부정부패의 척결 및 기초질서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사교육비를 축소하고 허례의식을 척결하며 음식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넷째,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문화서비스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양삼승 영산대 석좌교수는 정신문화를 선진화 하는 방안으로 타협·협상·중용을 제시하면서 “교조적인 결과보다는 실용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한 선진화를 이룩하자

“법제도적 측면에서 민간분야 비리의 경우, 현행의 법체계상으로는 개인이 처벌받으면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법 태도이기에 법인 등에 대하여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를 낮추는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정부의 취약한 재분배 기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와 과세공평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주성 교원대 교수는 “과거 성적 위주의 교육프레임이 바뀌지 않고는 저성장 고령화시대를 이끌어갈 후속세대를 키울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독립심이 있는 자아를 키워주고 평생 스스로 교육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의 의식개혁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 열기는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았고, 경쟁에 실패한 학생들을 패배자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국민 전체의 행복 총량이 낮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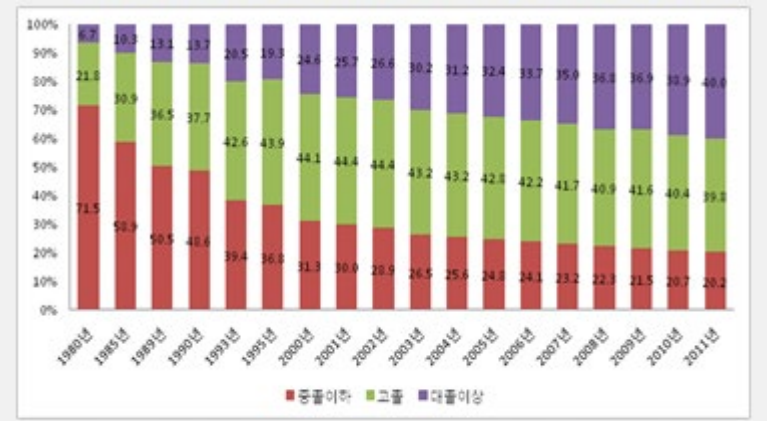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의식개혁이 시급

또한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 열기는 한국식의 비교문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면 부모는 콧대를 세우고 그렇지 못한 학부모와 자식에게는 연민의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교문화는 공리적인 입장에서 매우 큰 불행을 초래합니다.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열기가 왜 발생했는지 근원을 고민해보았습니다. 고학력자가 별로 없던 70~80 년대에는 고학력만 갖추고 있다면 부와 권력을 손에 얻기 쉬웠습니다. 따라서 ‘고학력이 답이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것은 사회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정작 대학 졸업장 가지고는 그들이 고학력으로 얻고자 하는 부나 권력을 얻기 힘듭니다. 80 년대 인구의 6.7%가 대졸이었고, 20%가 고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진학률은 80%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학 졸업장의 위상은 80 년대 고등학교 졸업장만도 못한 것입니다.



시대별 학력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고학력을 통해 왜 부를 얻고 싶어 하는 지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그리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길 원합니다.

그리고 돈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물질을 향유하면서 행복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에서 누릴 행복의 총량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또한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향유하여 행복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화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물질을 향유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원하며 불만족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에게 있어 가장 최종적인 가치는 행복

따라서 이러한 풍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질문화, 비교문화가 만연한 풍조를 없애고 물질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방법으로도 통해서도 행복을 성취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Dennis Gabor 는 그의 저서 '성숙사회'에서 선진화를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공존하면서도 정신적인 풍요를 최우선시 하는 평화롭고 자유스러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즉,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도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환의 시작으로 우리는 왜곡된 교육 열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우리 교육은 학벌주의, 성적지상주의, 금욕주의 학교생활을 강조하였고, 남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한다는 왜곡된 경쟁심은 공동체 의식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곡된 교육 열기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왜곡된 교육 열기를 '현실 바로 알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바로 알기'란 무엇일까요? 현재 많은 학부모들이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맹목적으로 공부를 강요하고 대학만 졸업하라고 합니다. 대학만 졸업한다면 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대학졸업장이 더 나은 삶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현실은 어떤가요? 막연히 '졸업하면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대학 졸업을 했더니 취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등록금과 타 지역 생활비용 등을 포함한 몇 천 만원이 되는 대학생활비를 아무런 소득 없이 낭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현재 대학진학률은 80%이고 대학 졸업장은 절대 취직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했을 경우, 진학했을 경우 어느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는 설명회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진학이 아니라 다른 진로를 통해서도 충분한 소득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대학진학을 한다면 이보다 낮은 소득을 벌게 될 것이라고 확률적으로 인지시켜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생긴다면, 맹목적인 대학 보내기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현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또한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학벌이나 물질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정신적인 행복임을 누차 강조하여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행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 개혁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연을 들은 소수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러한 소수가 또 다른 소수를 움직인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회는 변모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⑪ 정승훈(단국대학교 철학과)



정신적 문화적 풍요의 시대를 열어가자

물질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풍요를 추구함으로써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저출산·고령화·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고자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 교수는 "더 좋은 직장과 더 나은 소득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모두에게 불행만을 제공할 뿐"이라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물질 만능의 소비를 통한 만족 추구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 윤리도덕 부활운동 전개, 부정부패 척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이 직접 참여해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과당경쟁의 지배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문화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사구시, 경세치용의 절제사회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교육비 축소, 허례허식 척결, 음식쓰레기 및 과음 과식 지양 등의 3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토론자로 나선 김주성 교원대 교수는 "과거 성적위주의 교육프레임이 바뀌지 않고는 저성장 고령화시대를 이끌어갈 후속세대를 키울 수 없다"면서 "독립심이 있는 자아를 키워주고 평생 동안 스스로 교육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양삼승 영산대 석좌교수는 정신문화를 선진화 하는 방안으로 타협·협상·중용을 제시하면서 "교조적인 결과보다는 실용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해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를 낮추는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정부의 취약한 재분배 기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와 과세공평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적 위주의 교육을 받고 컸는 우리내래 학생들

이날 토론회의 내용 중, 현행 성적경쟁위주의 교육이 변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창의적, 다변화적 기업환경에서 일할 젊은이들이 양성될 수 없다는 발언이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이런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 예술 중심의 교육을 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정서발달이나 창의력도 촉진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현행 문화의 날을 확대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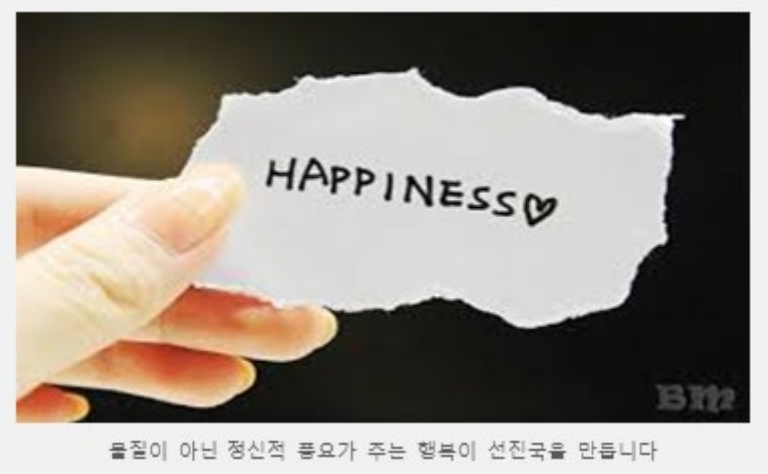
영화나 공연 등의 문화를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부시책인 문화의 날은 현재 한 달에 한 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욱 확장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가 있는 날로 만들면 어떨까요?


문화계 맸는 날을 확대해재!

그렇다면 일반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문화산업에 재투자되어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중고 대학생들 만이라도 매주 토요일 문화가 있는 날로 만들어 문화적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문화에 투자해 더 높은 수준의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나 사회갈등에 있어서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⑫ 조형원(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물질이 아닌 정신적 풍요가 주는 행복이 선진국을 만듭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내면적 풍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고자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101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 교수는 오늘날 한국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국가 전략에 따라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복도와 만족도 등의 비경제적 요인의 개선은 경제적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김용하 교수는 한국의 행복도가 낮은 이유로 사회적 지원, 선택자유, 관용, 부패 등 정성적 지표가 낮다는 점을 꼽으며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신 측면에서 도덕적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며, 경제적으로는 절제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하 교수는 정신적 풍요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로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사회를 구축할 것" 둘째로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해 삶의 안정감을 줄 것. 셋째로 실사구시, 경세치용의 절제사회를 이룩해 정신적 성숙을 도모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토론자인 양삼승 영산대 석좌교수는 결과중심문화가 정신적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타협, 협상, 중용의 정신문화를 정착하고 교조적인 결과보다는 실용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성 교원대 교수는 "과거 성적위주의 교육프레임이 바뀌지 않고는 저성장 고령화시대를 이끌어갈 후속세대를 키울 수 없다"면서 "독립심이 있는 자아를 키워주고 평생 동안 스스로 교육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를 낮추는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정부의 취약한 재분배 기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며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실현, 과세공평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병구 교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다수대표제 국가에 비해 사회지출의 규모가 크고 조세 및 이전지출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크다는 점을 제시하며,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대하여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각 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사회적 소수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가 사회지출을 확대하고 불평등을 개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례대표제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의원이 국회에 진출한다면 비정규직을 위한 목소리가 법안에 더 잘 반영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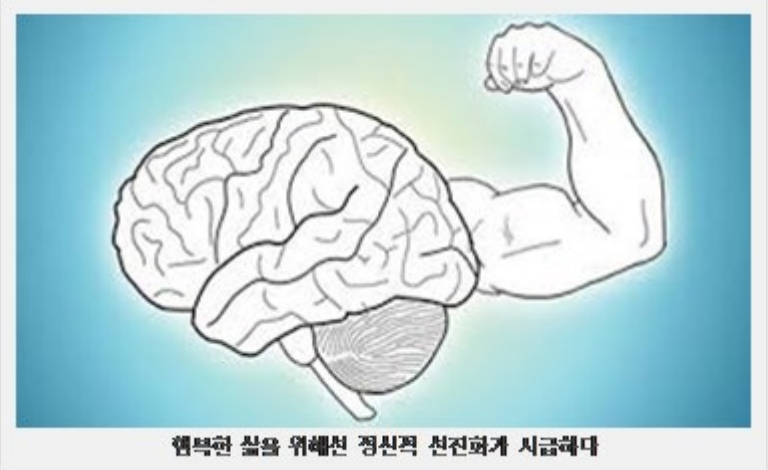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은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축소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20 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자체도 47 석으로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중도 줄어들어 비례대표의 대표성 또한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선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분배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용의 미덕도, 부패 척결도, 경제적 선택의 자유도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분배 개선이 정신문화 성숙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비례대표제가 강화되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정신문화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한국도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1 출처: http://gdrcoon.tistory.com/375
사진 2 출처: http://blog.ohmynews.com/jeongwh59/291833
사진 3 출처:
http://forestofdepth.tistory.com/entry/%EA%B6%8C%EC%97%AD%EB%B3%84-%EB%B9%84%EB%A1%80%EB%8C%80%ED%91%9C%EC%A0%9C%EC%9D%98-%ED%95%9C%EA%B3%84

⑬ 주아람(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 한국 경제의 성장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신적 선진화의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는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101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발제자인 김용하 교수는, '진정한' 풍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질 만능의 소비를 통한 만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사회는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고,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생활 문화가 발달한 실사구시의 정신이 바탕이 된 절제 사회임을 주장하며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문화의 지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과거의 성적 위주 교육 프레임으로부터 탈피해 장기적 시각으로 독립심 있는 자아를 키워주고 평생 동안 스스로 교육하면서 변화에 적응해나가는 능동적인 인간으로 키워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삼승 변호사는 결과중심의 사고방식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타협과 협상, 중용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비하여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 과세의 공평성 강화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 시장소득의 형평성을 회복하여 국민의 행복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일과 삶의 균형 회복의 기초 여건이 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행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현재의 경제적 수준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수준인 '잠재 행복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기존의 양적인 확대만을 추구하는 경제 성장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신적 풍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 사회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요? 일이 있다면 휴식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잦은 야근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그저 '노동만을 일삼는 동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게 드물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은, 높은 임금과 금전적 보상보다도,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외면하고 공무원의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지난 2 월, 9 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수는 역대 최고수준인 22 만여 명에 육박해 54:1 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데서 볼 수 있듯, 계속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저녁 있는 삶을 찾아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가'를 단순히 노는 시간, 비효율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가시간과 휴식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이며 창의성을 도모하여 더 나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재생의 시간'입니다.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사색과 휴식의 시간에 뒤따르는 깊은 심심함을 일컬어, '경험의 알을 품고 있는 꿈의 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성장과 성과 일변도의 사고방식에서는 결코 꿈의 새도, 창의성도 나올 수 없어 더 나은 생산성을 보이기도 힘들며,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궁핍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선 기업들이 먼저 이러한 성과 일변도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통해 재충전을 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내에 여가와 문화 센터나 취미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야근과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잘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을 이행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를 갖추어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지 않고 첨단 산업과 히든 챔피언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유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를 비롯한 사람들의 자체적인 인식변화도 필요합니다. 소비재에만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닌 문화 산업과 여가 산업의 경험재의 소비를 늘려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 서비스 산업의 수요가 확대될 수 있고, 더욱 더 양질의 문화 서비스 산업의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의 성장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⑭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불릴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비하하고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자기 나라를 지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를 지옥같다고 말하는 걸까요?

유엔산하 '지속가능한 발전해법 네트워크'는 지난 2012 년부터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하는데 이것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별 행복지수는 1 인당 GDP, 건강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인식 등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산출됩니다.

2016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8 개 조사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는 58 위를 기록해서 2015 년에 비해 11 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최상위권에는 역시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1 인당 GDP 와 건강수명 같은 객관적인 정량지표 측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인식 측면 등 정성적 지표들은 크게 뒤떨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벗어날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헬조선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행복지수가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정성적 지표는 사람들의 주관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정량지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관적인 정성적 지표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 정상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실제 처지보다 불행하게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무언가가 바로 전교조와 종북·운동권세력, 과도한 비교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전교조들에게 학창시절 12 년 내내 세뇌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지배하는 나라다, 독재세력들이 만든 나라니 쓰레기다, 투쟁과 혁명으로 나라를 바꿔야 된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들으며 자랍니다.

종북·운동권세력도 이와 비슷한 소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뇌시키고 선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소득이 100,000 달러가 되어도 사람들 입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전교조와 종북·운동권세력이 없어지기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과도한 경쟁의식도 문제다

또한 과도한 비교문화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도한 경쟁을 낳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두가 시험에서 1 등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사교육을 받습니다. 경쟁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쟁이 과도하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제 3 자가, 특히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생님들이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부모들이 수용을 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등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무조건 공부를 강요합니다. 해도 안 되는 애들한테 공부를 강요하니깐 아이들의 정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세상에 엄청난 불만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사교육비는 일종의 투자로 볼 수 있는데 투자의 수익이 굉장히 낮게 나오니 부모도 불행해지고 노년생활도 불행해집니다.

또 드라마를 보면 맨날 재벌 3 세와 평범한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모두가 신데렐라가 되기를 꿈꾸고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니 불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아귀다툼을 벌일 필요는 없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과도한 경쟁의식을 보여줍니다. 내가 무조건 제일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피가 섞인 친척이 잘 되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에 불만을 갖습니다.

모두가 1 등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야 할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지도층이 되어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경쟁을 피한 사람들과 경쟁에서 진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게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인 전교조와 종북·운동권세력, 과도한 비교문화가 사라지고 사회적 지원이 커지며 사회지도층이 부정부패 없이 국가를 위해 노력한다면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북유럽 국가들과 순위다툼이 가능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⑮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지속되는 저성장 속에서 우리는 불행해져만 가는 것일까요?

최근 IMF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 년 1 인당 GDP 는 27,513 달러로 2014 년에 비해 457,7 달러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 선진국들 대부분이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음은 인터넷 신문만 들어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본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 성장을 축소시켜 모두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행해져 가고만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발전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규모나 지표 등을 보면 우리나라는 높은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와 행복은 정비례관계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아예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경제적인 가치에 너무나 치중되어 있습니다. 피난민이 생기지도 않고, 지진도 발생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정말 지옥인 걸까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행보다는 행복을 더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에게 올바른 철학 교육과 문화 활동이 뒷받침되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경쟁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합니다.

누군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경쟁심에 해외여행을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정말 그 일에 뜻이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개인의 선택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철학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디어와 타인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에 도달하려고만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철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철학을 배움으로써 자신만의 올바른 기준과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만들어 놓는다면 타인이 만들어놓은 행복의 기준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우리에게 정신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 활동입니다. 우리는 문화 선진국으로 많은 국가들에게 K 팝 열풍 등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연이나 영화, 미술관 관람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고 있을 뿐 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 문화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은 우리의 정신적 풍요로움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소식들은 우리를 침체시킬 뿐입니다. 좀 더 많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비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득 분위에 따라 나누거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적으로 힘들다면 특정 공연이나 전시회 등을 분기마다 2,3 회씩 아주 저렴하게 보러 갈 수 있는 쿠폰을 서민들에게 준다는 등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 활동의 제공은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동시에 우리의 견문을 넓혀 또 다른 행복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은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할 것이며 철학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된다면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여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좋아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행복을 찾기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복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권순형(서울대 경제 3) :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보고 있습니다. 뉴노멀, 글로벌리제이션, 4 차 산업혁명, 다품종소량생산 시대의 도래가 그것입니다.

지금은 만성적 저성장, 경기순환의 약화, 소득불평등 심화가 특징인 뉴노멀 시대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으로 모두가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조금 개선되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함께 크게 무너집니다. 인공지능 중심의 4 차 산업혁명으로 창의적인 인재만 살아남고 다른 일자리는 크게 줄어듭니다. 다품종소량생산의 확산으로 개성이 없고 감성에 호소할 수 없는 상품은 팔리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에 대비한 백년대계의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OECD 1 위의 사교육비 지출, 70% 초반의 대학진학률로 대표되는 성적지향 무한경쟁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고, 더 나아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불행한 한국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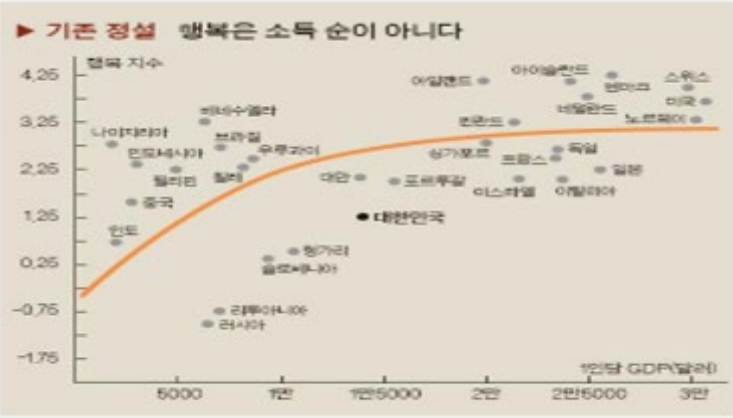
배근표(서울대 경제 3) : 우선 우리가 왜 교육을 받는지 생각해봅시다. 현실적으로는 취업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은 자신의 꿈과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제도는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학업성취도는 높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학생들은 왜 공부하는지도 모른 채 밤낮으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원빈(서울대 경영 4) : 학생들의 생활이 마치 기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금방 지루해집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교육은 이러한 인간만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시기에 성적중심의 무한경쟁 교육제도를 정착시켰던 것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생존'이라는 키워드가 모두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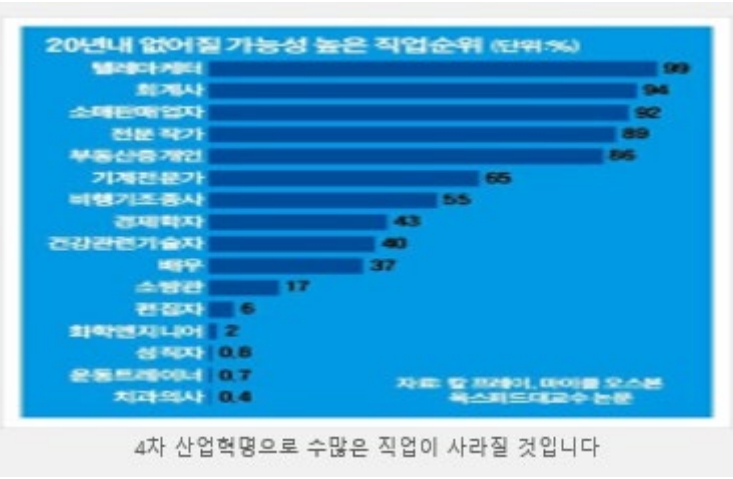
덕분에 우리나라는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끼니를 걱정하던 나라는 오늘날 세계 11 위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먹고 살 만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 '생존'이라는 키워드가 공감을 얻기 힘듭니다. 우리 교육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소득 순이 아니다'

나세정(서울대 경제 3) : 행복경제학의 대부 Richard Layard 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행복은 소득 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행복과 소득이 비례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거의 사라집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하다면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사회정의, 공동체, 신뢰, 환경, 여가와 같은 정성적인 요인이 더 중요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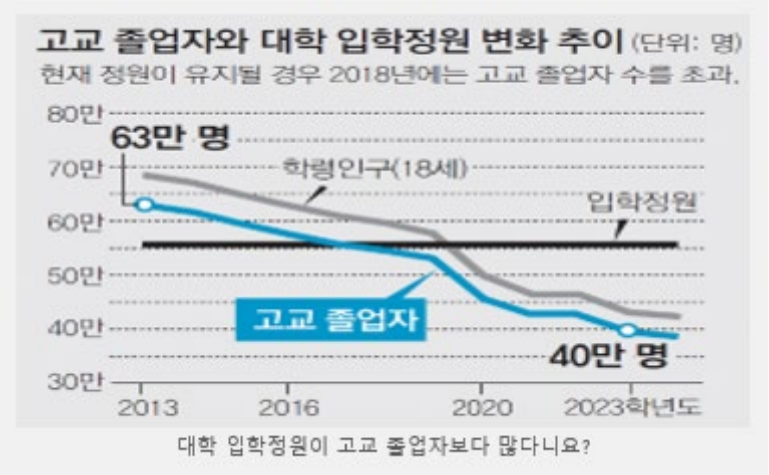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교육에도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쟁과 성적에 따른 단순한 보상체계로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없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동기를 자극하기도 힘듭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입니다

송수혁(서울대 경제 4) : 사회가 성숙하면서 창의성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중심의 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것이 자동화·기계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의미는 반복과 훈련이 아니라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소모적인 경쟁은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과열되어 있습니다. 굳이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은 억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은 모르는 것과 알고 싶은 것을 배워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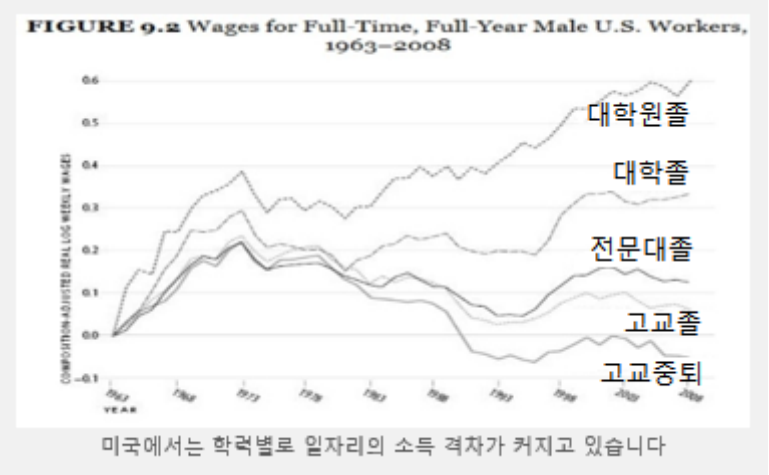
김진현(서울대 경제 3) : 우리나라에 대학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고등학생이 모두 대학에 진학해도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등록금만 내면 대학에 갈 수 있으니, 학문에 뜻이 없어도 너도나도 일단 대학에 진학하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다른 길을 찾거나 빠르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실대학과 경쟁력이 없는 대학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권순형(서울대 경제 3) :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는 매몰찬 경쟁에 몰입했습니다. 절대빈곤이 퇴치된 지금, 매몰찬 경쟁은 정신적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떨어진 청년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의 엘리트들은 계속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학생들은 적당한 경쟁을 거쳐 적당한 교육만 받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부터 공부를 계속할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제 소수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대신 기술교육을 받을 실업계 고등학교를 확대해야 합니다. 남아도는 부실대학, 경쟁력 없는 대학을 전문기술대학으로 개편하여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진학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전문적인 기술장인을 육성해야 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진사회를 닮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학력별로 일자리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원(서울대 심리 3) : 학생들이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원인으로는 '불안'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동화·기계화로 중간학력/중간임금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학력에 따른 소득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자 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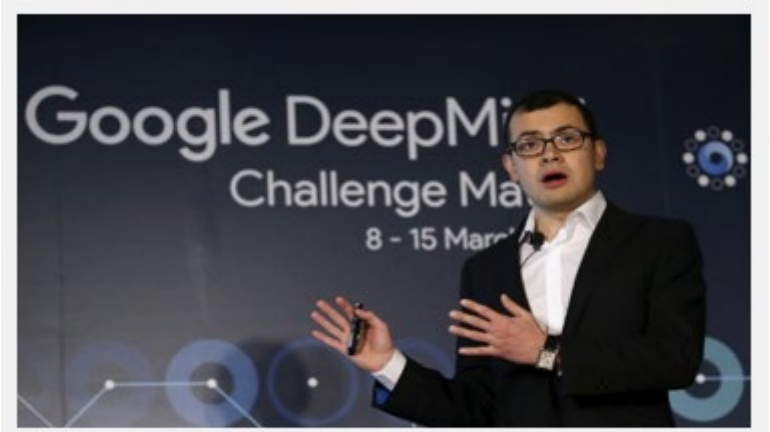
입시 경쟁이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누구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낭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의 값어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 실낱같은 기회라도 얻기 위해 대학 진학이라도 해야겠다는 개인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건 참아도 희망이 없는 건 참을 수 없다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근표(서울대 경제 3) : 정말 공감하는 말입니다. 최근까지도 무상복지나 청년수당 정책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무분별한 복지 정책은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실패하더라도 국가가 보호해줄 수 있다는 확신, 재기할 때까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제도와 복지제도를 개편해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대학 진학에 목을 메는 현상은 줄어들 것입니다.

김진현(서울대 경제 3) : 아울러 능력만 있다면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 없이 마음껏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 계층 출신의 똑똑한 학생에게는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장학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고소득 계층 출신의 학생들에게는 많은 학비를 부담시켜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기부입학제도라고 해서 수 억, 수십 억 원의 등록금을 내는 학생에게 입학할 자격을 줍니다. 대신 그 돈을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줍니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공지능 알파고는 오랫동안 한 우물만 판 결실입니다

나세정(서울대 경제 3) : 최근 인공지능 알파고가 화제였습니다.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 마인드의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는 고등학교 1 학년 때부터 게임 개발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하사비스는 게임을 개발하면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엿봤고,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그는 인공지능에 대해 더 공부하기 위해 인지신경과학에 도전해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곧 인공지능 중심의 4 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단기간에 성적을 내는 교육 방식으로 길러진 인재, 반복과 훈련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길러진 인재는 인공지능에 밀려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인간이 하는 일의 대부분을 대체한다면,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꾸준히 공부하고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내는 한 두 사람의 인재가 한 국가와 수 억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으로 행복해집시다!

김원빈(서울대 경영 4) : 교육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급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학생들의 '불안' 요소를 없앰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교육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형(서울대 경제 3) : 알찬 토론 감사합니다. 뉴노멀, 글로벌리제이션, 4 차 산업혁명, 다품종소량생산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적지향 무한경쟁 교육으로는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도 없으며,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 소모적인 경쟁을 막아 각자가 능력, 흥미, 적성에 따라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실대학과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수를 줄이고, 실업계 교육과 실업전문대학을 확대해야 합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제도를 도입하여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교육열은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세계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물론 복지의 무분별한 확충은 경계하고, 인센티브를 잘 따져서 효과적이고 정교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손재정(고려대 중국학부 3 학년) : 대학생들의 토론 주제는 '정신적 삶의 풍요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또는 활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로 정하겠습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바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종(고려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1 학년) :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신적 삶의 풍요를 느낄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노오오오력이 부족하다'는 등 높은 취업장벽을 풍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노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호균(고려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2 학년) : 헬조선이라고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역으로 정신적 삶의 풍요를 확보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믿습니다.



김성원(고려대 컴퓨터 및 전자공학부 2 학년) : 헬조선이라는 코드가 뜨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정신적 삶의 풍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에는 우선 노력으로 모든 것을 거머쥘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쟁의 가운데 파고들어 자신을 혹사하기보다 여러 가지 것을 해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민영(고려대 전자 및 정보공학과 2 학년) : 헬조선이라고 조국을 욕하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훨씬 국민다운 자세가 아닐까요. 내 생각에 정신적 삶의 풍요를 확보하는 가장 빠른 길은 투표하는 것입니다.

20 대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한국에서 최저치를 달립니다. 그런데도 대학생들은 정치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볼멘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풍요를 확보하려면 대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보성(고려대 중국학부 3 학년) : 정신적 풍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질적 욕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이 되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구매력이 없으니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지 않은가요. 따라서 정신적 삶의 풍요를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나서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같은 백만장자가 미국 대선을 뒤흔들고 있고 과거 정주영 회장도 대선에 나오지 않았던가요. 정직하고 뚝심 있는 기업가들의 노력이 한국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적 풍요도 식후경

이준혁(고려대 공공행정학부 1 학년) :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곳은 대기업입니다. 높은 대학 등록금에 토익, 토플, 인턴, 서포터즈, 공모전, 유학 등등 너무나 높은 고스펙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사회현실은 대학생들이 곧 말라 죽게 하는 열사의 사막과 같습니다.

구세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 맞춰 사는 대학생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열정 PAY 를 원하는 것은 그 또한 구세대의 욕심일 뿐입니다. 대학생들이 정신적 풍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기업에 취직하고 노력을 보상받습니다.(취직 후 정신적 스트레스는 예외)

두 번째로 임금을 신경 쓰지 않고(욕심을 버리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습니다(처음에 임금이 적은 것은 참을 수 있겠지만 가장이 된다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정신적 풍요를 확보해는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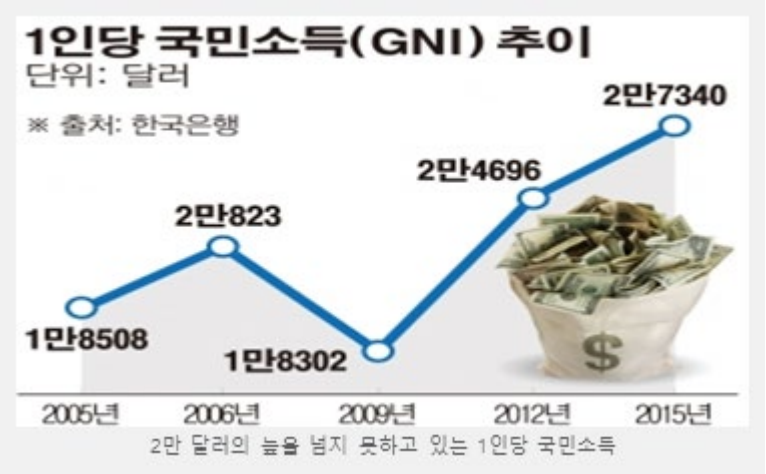
손재정(고려대학교 중국학부 3 학년) : 정신적 풍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자신을 갈고 닦으며 때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지도층은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고 공정함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 즉, 신뢰를 사회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새 급부상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은 이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공익, 또는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모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의 염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매우 좋은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명사들이 주축이 되어 테마를 설정하고 지역민, 대학사회와 연계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해내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연계가 강화되고 또한 지역민들 사이에 신뢰가 구축되어 지역의 정신적 풍요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승현(고려대 경제 3):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우리나라도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풍요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성장 상태에서도 물질적인 것 이외에 정신적·문화적인 풍요를 찾는 여유가 생기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방법들 중에는 교육의 개선도 포함되므로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진수(고려대 미디어 3):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지나친 학벌주의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도 모른 채 무조건 대학 입시 준비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사교육비 과다 지출, 학력 인플레 현상, 청년 실업, 만혼에 출산율 저하까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나친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력중심의 채용, 승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학교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기성세대와 학부모들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범국민적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지원(고려대 경제 3):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누구나 경제 여건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꿈을 키워줄 수 있도록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식의 습득보다는 아이디어 창출이나 도전정신이 더 중요하므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한 줄 세우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지닌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한 줄 세우기'식 교육의 문제

조유정(고려대 경영 3): 저는 사회적으로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으로 인해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인 학생부종합전형이 모든 계층의 학생들에게 공정한 제도인가 하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이동의 주요 통로입니다. 교육의 기회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국민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소연(고려대 영문 2): 저는 직업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유교적 전통에서 유래하는 '사농공상'이라는 위계적인 직업관에서 탈피하여, 모든 직업이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맞은 직업 선택의 중요성

또,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생 자신이 직업에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면 직장인으로서의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현(고려대 경제 3): 오늘 토론에서는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학벌주의 타파, 공교육 정상화, 신뢰 회복의 중요성, 그리고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과 같은 여러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1: 이데일리
2: httpblog.naver.comnhrck172957320
3: 세계일보
4: http://blog.naver.com/caffrey46/220667614809


선진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고대 동기들끼리 토의해보았습니다.

이주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2 차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연구모임에 참가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2~3%대인 저성장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성장 국면에 맞추어 물질 성장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내면적 풍요를 추구함으로써 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담을 통해 선진 한국에 향한 실천적인 방안을 부담 없이 학우들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토의주제는 '왜곡된 교육 열기의 해결방안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수험생활을 걸쳐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수험생활 동안 누구보다 뼈저리게 왜곡된 교육열기를 느꼈을 겁니다. 크게 어떤 것이 왜곡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이현민(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흔히들 한국식 교육이 너무 경쟁이 과도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과도한 경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문제라고 봅니다. 과도한 경쟁이라도 정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쟁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선행학습이나 과도한 시간의 사교육 같은 정작 학업 성취에는 효과가 없는 일로 역량을 낭비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량낭비는 잘못되었고 따라서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원중(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동의합니다.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선행학습이나 과도한 시간의 사교육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았으면 그렇게까지 시키진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왜곡된 교육열기는 학벌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곡된 교육열기로 인해 학생들은 청년기를 의자에서만 보낸다.

물론 다른 나라도 학벌은 중요하지만 한국에서의 학벌은 어느 나라보다 중요합니다. 지나친 학벌주의로 인해 '입학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 대입시험은 왜곡된 교육열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잠시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80 년대에는 '입학만하면 만사형통'일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2010 년대부터는 취업난으로 인해 과거 대학생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취미나 순수학문 분야의 동아리는 신입생들이 없어서 맥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졌고, 열람실에는 유례없이 사람이 많습니다.

심한용(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수능과 대입전형이 교육부의 입맛대로 이리저리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대입전형이 자주 바뀌고 세분화되면 정보가 취약한 사람은 준비를 할 수 없게 되어, 정보가 없는 사람 즉 삶의 여유가 없고 좋은 학군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전형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수능은 교육부의 입맛에 맞춰서 만점자를 4%나 배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EBS 를 연계하여 만점자를 많이 배출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그만 남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암기식 교육을 비판하면서 정작 EBS 문제를 암기하길 원하는 모순적인 행태도 고쳐야 합니다.

차준용(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방금 말하신 현상은 교육부가 제대로 된 교육제도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유권자는 학부모가 나서서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주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교육부의 일관성 없고 인기영합적인 제도도 분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학부모를 상대로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맹목적으로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고학력을 통해 왜 부를 얻고 싶어 하는 지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그리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길 원합니다. 그리고 돈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물질을 향유하면서 행복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에서 누릴 행복의 총량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또한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학원을 보내고 의자에만 앉아있게 만들어, 대학을 보낸다고 해도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여러 시야를 갖지 못한 아이는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가치관은 평생의 가치관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 경험을 하지 못하여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아이는 결국 불행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학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림으로 학부모들을 각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대세가 된다면 충분히 왜곡된 교육 열기는 한 순간에 꺾일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대학도 중요하지만 다른 정신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정영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학부모들에게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없는 자녀를 억지로 대학을 보내려는 풍조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했다시피 더 이상 대학 졸업장으로는 취업을 못합니다.

스카이에 진학을 해도 자체적인 능력과 생산성이 없으면 취업이 안 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역량이 없는 자녀에게 엄청난 사교육을 투자해서 간신히 대학에 보내봤자, 자녀는 생산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의 방편으로 자녀들에게 과도한 사교육 투자를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경제추세라면 대다수의 자녀는 분양해줄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벌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사교육보다는 노후준비를 다른 방편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현민(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동의합니다. 게다가 자녀의 행복측면에서도 억지로 공부를 시켜봤자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후대비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든 억지로 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집들이 다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뒤쳐지는 것은 아닐까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역량이 좋은 아이라면 충분히 해낼 것이고, 공부에 역량이 부족한 아이는 다른 방편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오직 대학입학 수학능력평가만이 능사가 아니라 고등학생들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널리 보여줘야 하고 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도 양질의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왜곡된 교육열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학우분들의 열띤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왜곡된 교육열기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러한 토의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의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은 잊지 말고 실천하여 우선 우리부터가 선진한국을 위한 발걸음을 한 발자국 걸어 나가도록 합시다.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한슬(정외 3): 안녕하십니까?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여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을 중요시 했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이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직 대학만을 가기 위한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저는 이를 위해서는 대학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교육개혁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지수(사학 2): 너무 잦은 입시제도의 변화가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입시제도를 만들면 적어도 5~10 년은 해보고 바꾸는데 우리나라는 3 살 터울 저와 동생 간에도 차이가 있을 만큼 너무 많이 바뀝니다.

이는, 그 교육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 가끔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정책이 만들어졌다가 곧 바로 사라질 때마다 학생들은 본인들이 실험대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사람 사귀는 일에서도 길게 만나봐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다 보면 그 정책이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고 바꾸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교육정책을 만들면 최소한 5 년 이상은 시행해보고 바뀌도록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다윤(정외 2): 동의합니다. 1 년 만에 입시제도가 바뀌기도 하니까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하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어렵습니다. 교육정책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재환(경제 2): 동의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등급제 수능처럼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장기간 시행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예비시행을 해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한 번 정책을 만들 때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정책 방안은 오히려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리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학 입시가 좋은 사례로 많이 언급되곤 하는데, 저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는, 프랑스에는 채점자에 대한 신뢰가 존재해서 서술형으로 시험을 치러도 객관적인 채점이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객관식 형태를 만들었으며, 정시가 그나마 제일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어렸을 때에 꿈을 찾자는 말이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은 수학능력시험이니만큼 얼마나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수능공부를 해서 대학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능은 이전 학력고사보다 훨씬 나은 시험입니다. 예전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탐구과목만 10 개 이상을 보고 지금보다 더한 기계적인 암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능에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많이 개선된 것이며 앞으로도 개선하면 더 나은 시험이 될 것입니다.



진로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김한슬(정외 3): 대학에 오기 전에 진로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서기 힘들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입생을 전공과 상관없이, 문과나 이과의 구분도 없이 뽑은 후에 1~2 년 간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고 그 이후에 본인의 전공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목을 실제로 배운 적이 없다면 학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힘듭니다. 저의 경우 저의 학과 과목 수업에 만족하고 제가 원하던 것을 배우고 있지만 주변 친구들 중에 자신이 생각했던 학과랑 실제 배우는 것의 괴리가 커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김지수(사학 2): 그게 오늘날 자유전공(자전)이라는 학과인데 김한슬 학우님께서 언급하신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법대가 없어지는 시기 즈음하여 법대를 대신한다는 느낌으로 자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김한슬(정외 3): 자유전공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과도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나 학과를 자유롭게 해버리면 소위 상위 대학이나 상위 학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개혁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정원을 감축해서 대학 졸업자 수가 줄어들면 overeducation 문제도 줄어들 것이고 '대학을 굳이 졸업하지 않아도 내 능력을 개발하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대학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재환(경제 2):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 못 간 사람들을 패배자 취급하는 등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다윤(정외 2): 동의합니다.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스펙을 쌓기 위해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을 위한 경쟁에서 스펙을 위한 경쟁으로 바뀔 뿐 경쟁이 근본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사회 기득권층이 이미 이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김한슬(정외 3): 힘들긴 하겠지만 조재환 학우와 이다윤 학우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대학 개혁 이후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학을 나오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자신의 진로에 무관하게 입시교육을 받고 대학에 가야만 하는 사회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까지는 모두가 받되 고등학교부터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잘 하는 것을 찾아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학업에 뜻이 있는 학생은 고등학교 교육을 거쳐 대학을 가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중학교 졸업 후에 취직을 해서도 차별 없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도 자신의 진로에 따라 일반계고, 실업계고, 예술계고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무슨 진로를 선택하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성적만이 좋은 학생의 기준일까요?

방주현(정외 2):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바로 뛰어들면서, 그 동안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김한슬 학우가 말한 것이 실현되려면 학교는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자신이 잘 하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른데 국, 영, 수 위주로 성적평가 제도가 되어 있다 보니, 다른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제도에서 도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은 꿈이라는 것 자체가 성적에 의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성적은 사람들의 재능을 다 반영할 수 없는데 그것에 의해 꿈이 제한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지수(사학 2): 그런데 꿈을 성적에 너무 관계 없이 해버리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꿈인 사람이 진짜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 아닐까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재능의 전부는 아니지만 성실성을 보증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꿈만 중요시한다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의 변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직업이 꿈이라면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김한슬(정외 3):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꿈이 학습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습니다. 예체능 계열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 '공부 못하는 아이들' '불량학생' 등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야가 무엇이 되었든 자신에게 소질 있는 분야를 찾아 노력하는 것에는 박수를 쳐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소질을 개발하지 못하고 좋은 학생이라는 기준을 성적에만 두는 교육은 행복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인식변환이 필요합니다.


소득에 의한 교육, 나아가 취업의 불평등이 사라져야 합니다.

조재환(경제 2): 예체능, 요리, 기술 등의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체능 계열에 소질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지 못하고 성적에 맞춰 대학을 들어오거나 일반 학교를 다니더라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한슬(정외 3): 그렇다면 정부에서 예체능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가난한 사람을 위한 공부(학습)환경은 잘 되어 있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집 같은 것은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고 무료로 EBS 강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학업 분야처럼 지원이 잘 되어 있다면 학생들이 돈 때문에 소질 계발을 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교육에는 꼭 수능교육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방주현(정외 2): 그 문제와 관련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소위 '스펙'이라는 것도 돈이 많은 사람들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자격시험을 보려고 해도 한 번 보는 데에 몇 십만 원씩 소요되며 인턴도 몇 개월간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김한슬(정외 3): 여러분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행복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이 여러 가지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정시를 확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 신입생을 학과나 문이과 구별 없이 뽑은 후에 다양한 과목 수강 후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교육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와 학과 서열화가 타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위해 대학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각자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국영수 위주의 성적평가제도를 수정하고 예체능분야나 기술분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득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도약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조형원(연세대 식영 4):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풍요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풍요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등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조세 및 이전지출을 강화해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지출이 커야 사회적 지원이 커지고, 경제적 여유가 관용의 미덕과 자유의 바탕이 되고, 개인의 위험을 보완할 복지제도가 있어야 부패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강화하여 재정여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 확대가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과반수 이상을 비례대표제로 운영하는 국가가 복지지출이 많고 재정이 건전하며 청렴도가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란 정당 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각 정당의 성향에 맞으면서도 다양한 사회집단을 대변하는 후보를 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소수자가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자 합니다. 우선 비례대표제가 복지지출, 재정건전성, 청렴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일(한국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 4):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집단을 대변하는 제도이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될 것 같아요. 복지제도가 강화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은(국민대 전자공학 3): 비례대표를 확대할 때 재정건전성과 청렴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만큼 정부 감시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좋은 법안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조형원(연세대 식영 4):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비례대표 제도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박준석(서울과기대 IT 전자공학 2): 각 정당이 어떤 비례대표를 선택했는지 앞으로는 유심히 봐야겠어요. 비례대표제 확대는 한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와 인터넷, 언론 등에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지원(한신대 중문 4):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전에 제가 찍은 후보는 낙선했어요. 투표한 정당도 한석도 못 얻었어요. 투표를 해도 당선이 안되니 투표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정치에 대한 재미와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송준범(광운대 전자재료 3): 저도 투표했던 후보가 낙선된 적이 많아서 그 마음 이해해요. 내 의견이 무시 받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비례대표제 확대는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감소시키는 제도니까요. 국민들의 정치 관심이 높아지면 민주주의도 분명 발전할 거에요.



비례대표제 개선을 통해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야 합니다

조근배(서강대 국제인문 2): 비례대표제가 정착되면 다당제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뒤베르대의 법칙에 따르면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소선거구제는 양당제 의회를 만든다고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다당제가 정착되면 양당제 카르텔이 사라지고 비토크라시가 어려워진다고 해요.

양당제 카르텔이란 거대 양당만 정국을 주도하는 현상이고 비토크라시는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라고 해요. 양당이 고정 지지층 확보를 위해 서로 발목을 잡는 데다가 국회선진화법까지 더해져서 국회가 마비되어 버렸어요. 경제살리기 법안도 통과가 안되고 있어요.

비례대표로 다당제가 정착되면 정치가 발전할 것 같아요. 시장경쟁에 비유하자면 지금은 정당이 2 개밖에 없으니 독과점 상황이나 마찬가지지만 정당 수가 늘어나면 정당 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경쟁으로 나쁜 정당은 퇴출되고 좋은 정책과 정당은 살아남는 과정이 계속된다면 정치인들도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이병탁(서울대 의용생체공학 1): 우리는 정당은 고를 수가 있지만 정당이 내세우는 후보도, 후보의 순번도 고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당 간부가 비례대표 자리를 거래하거나 자기 패거리끼리 나눠가져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세연(차의과대학 바이오공학 2): 비례대표 후보 선정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을 해서 국민과 당원이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면 비례대표 제도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지민(차의과대학 바이오공학 2): 투표장에서 정당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에게도 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당 득표율로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 수를 득표율이 높은 비례대표 후보에게 순서대로 배분하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 공정한 의석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형원(연세대 식영 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토론을 통해 비례대표제는 복지 지출과 재정 건전성, 국가 청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정치무관심을 감소시키고 국회 정상화와 정당정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비례대표제도를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풍요 또한 일구는, 그래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1 출처: 이순구화가[웃는얼굴]
사진 2 출처:
http://enews.songpa.go.kr/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384&sid=1&mvid=510
사진 3 출처: 한국경제신문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6303&c1=01&c2=01

④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주영 (명지대 국문) :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셔서 바쁘신 와중에 토론에 참석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국민 경제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84.2%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국민은 12.9%로, 사실상 국민의 97.1%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불황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 특히 20, 30 대 응답자 중 5 년 이상으로 대답한 비율은 46.0%로 젊은층의 경제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질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풍요를 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처럼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현대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년 째 인문학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박은지 (성신여대 교육학) : 몇 년 전부터 인문학 교육에 대한 열풍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국영수 위주의 입시를 위한 공부가 강조됐다면 인문학 열풍으로 인해 문학, 문화예술, 역사, 철학 등 인간 내면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교육이 재조명되면서 전문 교육 기관이 아닌 청소년문화센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센터 등 여러 단체에서도 인문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 고전 문학을 활용한 독서토론논술, 한중일 문화 비교, 영화, 문화유적 등 삶의 역량을 키우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강좌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좌들을 통해 배려와 존중의 인문 가치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정 (성신여대 법학) :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나 혼자면 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해 직장에서는 더욱 더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성과만 남습니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대학에서나 볼 법한 팀플 방식의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는 위치의 팀장, 과장, 부장급의 직원이 자신의 팀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팀원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해나가는 방식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간의 업무처리 방식이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상호간 소통이 힘들고 소속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개선한 것인데, 이후 이 지자체는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급의 역량을 높이고 현안업무에 대한 공유를 통해 조직일체감 형성으로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직장에서도 소통과 화합을 지향한다면 더 나은 업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성 회복을 통해 얻어지는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에서부터 공동체 사회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홍승희 (국민대 법학) :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꾸준히 공동체 활동과 교육을 통해 연대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또 학업에 열중하는 중, 고등학교에서도 이 교육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점점 더 경쟁 교육이 과열되고 있고 이러한 교육이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을 어린 시절부터 가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어린 시절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나 놀이 등으로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경쟁보다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주입식 강의보다는 토론식 강의나 팀플 위주의 과제 등을 통해 혼자 책상 앞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생각을 나누는 열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과정 속에 친구와 함께 유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녹여 놓음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의 가치관에 경쟁 대신 협동과 유대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명지대 국문)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현대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성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해봤습니다. 오늘날 침체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성 회복이 절실하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⑤ 영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주헌(영남대 국사 4) : 지금부터 제 2 차 영남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선진화 연구모임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성장을 겪으며 물질적인 풍요의 기반이 이뤄졌으나, 거기에 대한 부작용 중 하나인 '정신적인 삶의 피폐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정신적인 삶의 피폐화를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학우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듣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박준용 학우의 의견부터 시작하여 자유로운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용(영남대 역사 2):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인문학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와 철학, 역사, 지리와 같은 지식이 있어야 한층 더 성숙된 생각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열쇠로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먼저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독일 등의 기업문화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자신의 일보다는 가족을 생각한다는 면이 강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회사보다는 가족이며, 야근을 시킨다고 해도 대부분의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밝힙니다. 실제로 고용주 역시 야근을 강요하는 그러한 문화가 부재합니다. 우리도 너무 회사에 얽매여있어 가족에게 관심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박정민(영남대 역사 1): 우리나라의 기업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테라텍은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완전 자율 휴가를 줌으로써 논다는 분위기보다는 쉬고 싶을 때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게임회사인 넷마블의 경우 직원들의 호칭을 팀원이라 통일하여 수평적인 문화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상하관계를 강조하기에 회사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선했으면 합니다.

노태희(영남대 정치외교 2): 회사원들이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아껴주는 등의 복지도 필요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네이버 본사에 가봤습니다. 거기서는 음료수를 100 원에 팔고 아메리카노를 1000 원에 팔아 신기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하는 맛이 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천우창(영남대 역사 1):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더라도 분위기가 무거우면 더욱 경직되어 있기 마련이죠.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을 할 때 최대한의 효율성보다 정해진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한 힘들면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주헌(영남대 국사 4): 이제는 기업에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새내기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수영 학우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손수영(영남대 역사 1): 고등학교에서의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야자)을 하는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까지 고 3 이었습니다. 야자로 인해 귀가시간이 늦어지면서 가족들과 소통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도착하면 가족들은 취침하고 있었죠. 야자를 없앤다고 집에 있다고 보장되지 않겠지만, 분명 가족과 소통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동혁(영남대 역사 2):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학원, 과외 등의 활동으로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수업과 학교의 행정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학생과 선생이 서로 지치는 상황입니다. 좀 더 학교의 교육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역할의 분담과 능동적인 교육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정지연(영남대 정치외교 2): 우리나라는 대학생활부터 선후배관계, 군대에서의 상명하복 문화, 회사에서의 '상하관계' 질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수직적 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기

위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휴가의 보장과 야근의 지양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경우 휴가를 보내면 폰을 꺼놓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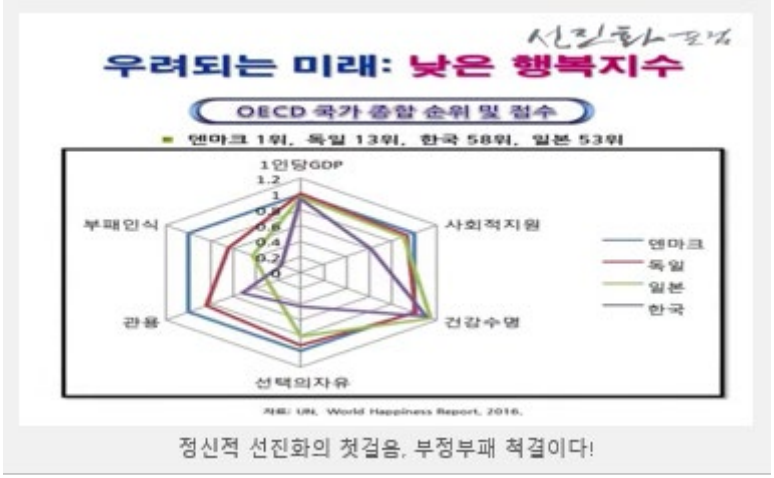
박준용(영남대 역사 2) : 저도 여기에 덧붙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우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했는데 실패를 범할 경우 팀 자체가 짊어지고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욱 경직된 문화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주헌(영남대 국사 4) : '일과 삶의 균형 방안'이라는 다소 어려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답을 해주신 학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까지는 절대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과 재화와의 경제기계론적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인간과 인간과의 사회유기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평성, 형평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력의 증대'와 '분배정의' 단계에서 윤리적인 가치판단이 경제생활로 나아 갈 수 있는 즉, '인본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회사원, 학생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더 좋은 의견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 차 영남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⑥ 경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효원(경상대 건축공 4) : 지금부터 경상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현시점에서 윤리·도덕의 붕괴로 부정부패와 가족파괴 등 아노미 현상이 만연하고,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대 간 남북 간 갈등도 증폭되고 경제도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 GDP 수준은 선진국 나라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해서 국민의 행복도가 증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신적 삶이 피폐화되었고, 국민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복지제도 확충, 관용, 선택의 자유,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삶의 질을 올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부패인식입니다. 따라서 부패인식을 낮추는 것이 국민들의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선진화와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박소연(경상대 건축공 3) : 국민들은 정부나 기관, 단체 등 사회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리를 저지르면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뇌물을 횡령했을 때 횡령한 뇌물만큼 사회에 환원시키도록 하는 것이지요. 실효성 있는 부정부패방지법으로 부정부패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 뇌물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뇌물의사를 보인 사람까지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솔미(경상대 건축공 4) : 저도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박소연 학우의 처벌 강화 방안에 더해 부패인의 사회 활동을 제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부패인의 정보와 비리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이처럼 사회적으로 부정부패에 관한 처벌을 중범죄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부패방지시스템을 가동해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후조치로서 손실이 일어난 이후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보다는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처벌 강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분야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배근(경상대 건축공 4) : 박소연, 이솔미 학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법과 제도로 부정부패를 척결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과거 청렴하지 못했지만 강력한 법과 제도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성공했고 현재는 아시아 최고 청렴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싱가포르처럼 정부직속의 독립적인 집행기관인 부패행위조사국을 만들어 공직자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정행위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패신고를 활성화시키고, 내부고발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회복하자.

강효빈(경상대 건축공 4) : 저 역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자는 학우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투명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 청렴도 1 위 국가인 핀란드는 매년 전 국민 소득세 내용을 공개하고, 세무당국이 모든 계좌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렴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고, 국가 신뢰도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김효원(경상대 건축공 4) : 국가의 부패지수는 국제화지수, 국민의 행복도, 소득분배의 불균형 여부, 행정의 투명성, 환경지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차원에서 투명한 시스템 구축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효빈 학우가 말한 핀란드의 경우는 공무원의 정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청렴도 1 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핀란드에서는 사회의 평등성, 균형성, 합목적성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부패 척결에는 사회의 투명성과 정직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연(경상대 건축공 4) : 저도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시스템 구축에 찬성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국가장학금 선정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계속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만이 상당한 이유는 정확한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료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소득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정보들을 매년 공개하고, 행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과정과 결과까지 정보가 모두 공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기관, 단체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소연(경상대 건축공 3) : 무엇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패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들이 부정부패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고 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자세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원(경상대 건축공 4) : 여러분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부패인의 사회활동제한 등 부패 처벌 강화를 통한 강력한 법, 제도 확충방안과 부패방지시스템의 사회 전반적 도입 방안, 독립적인 집행기관인 부패행위조사국을 운영하는 방안, 부패신고제도 활성화와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보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단체, 기관 등의 정보 공개와 정보검색을 통한 투명한 시스템 구축 방안이 제시되었고, 전 국민의 소득세와 재산세 내용을 매년 공개하는 방안 등 정신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부정부패 척결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이 정신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서 더 나아가 국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⑦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1) : 서강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물질적인 토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상위에 있지만 정식적인 피폐로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한 레벨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OECD 1 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식의 변화로 능히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이나 물질로 행복을 얻었다면 이제는 마음의 변화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통윤리 부활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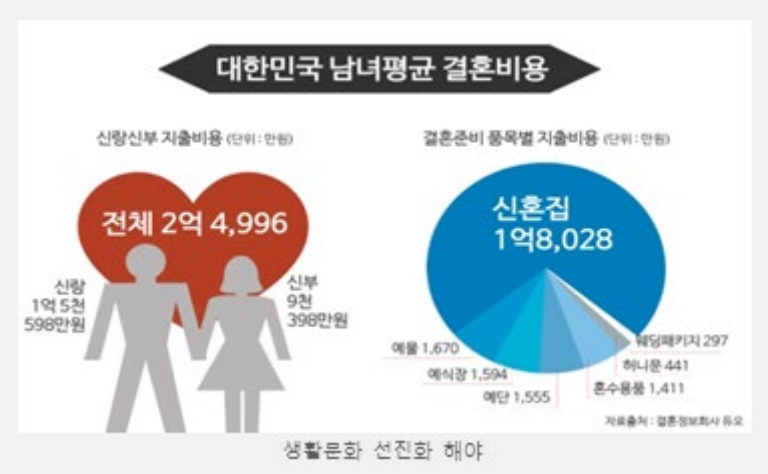
정금성(서강대학교 경영학과 3) : 우리 국민들에게는 위대한 정통윤리 도덕이라는 유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불명예도 전통적 윤리 도덕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운동으로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냉전 이후 우리사회는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려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2 위로 가정해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해체현상의 근저에는 성윤리붕괴로 인해 부부외도를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결과 가정의 가치관 교육과 윤리도덕 회복운동을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야 합니다.

박영미(서강대 중국어학과 3) : 고비용 결혼 문화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남녀의 고상한 관계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결혼은 사치라고 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신혼부부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결혼 여행을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당시에는 매우 호화스러운 여행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는 기본이고 하와이나 몰디브 같은 고가 여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비하면 동남아도 훨씬 좋은 여행이지만 사람들의 비교문화, 인식 때문에 신혼부부의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우주 신혼여행을 선호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하와이에 간다 해도 행복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작은 결혼식을 하고도 행복할 수 있는 생각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고성빈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1) :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문화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친화기업이 많아져야 하고 유연근로를 장려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요구와 기업에서의 요구를 잘 조절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들은 가정에서의 요구보다 기업에서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근, 밤샘근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과 가족에게는 행복이란 단어가 사치입니다.

얼마 간의 돈을 더 벌겠다고 연장근무 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정착을 위해 국가가 가족친화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교육을 선진화 해야 한다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 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교육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호준(서강대 컴퓨터공학과 1) : 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수와 대학진학률은 OECD 국가들 중 최상의 수준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문화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추진력이 되기도 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려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만 보아도 한 달 동안 지출되는 학원비가 100 만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부모님은 연장 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자식들은 자식대로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 하려면 좋은 대학 졸업한 학생과 보통 대학 졸업한 학생의 격차가 없어야 하고 대학졸업생과 졸업하지 않은 학생과의 임금격차가 없어야 합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과 기여에 대응한 보상체계가 구축되어야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정착을 도와야 합니다.



검소한 생활문화 도입해야 한다

김인호(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 저는 우리국민들의 과소비성향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가방, 자동차, 의류, 장식품 등을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필요성보다는 과시 목적으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지만 보여주기 위해, sns 에 올리기 위해 유럽여행을 떠난 적 있다고 말한 것 있습니다. 이러한 보여주기 소비문화는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소비가 대한민국사회에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1) : 불필요한 과소비나 분배의 양극화도 국민의 행복지수를 낮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희(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1) : 네 동의합니다. 우리국민들의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음식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음식쓰레기를 처리 하는 데만 수 천 억 원의 예산이 쓰인다고 합니다.

2015 년 추석에 전국의 휴게소들에 버려진 음식쓰레기만 해도 수 만 톤에 달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제한된 나라에서는 검소한 생활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남규(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저는 우리국민의 행복지수 상승의 열쇠는 소득의 불균형 해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는 선진국 레벨에 도달하지만 분배의 양극화는 심각한 레벨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경제의 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 여러분의 활기찬 토론 감사합니다. 경제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현재의 물질적 수준에서도 더 높은 행복은 가능합니다. 행복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고, 기대하는 목표 행복 수준을 낮추고 행복하는 방법을 수정하여 비물질적, 비경제적인 새로운 행복요소의 추가로 증진이 가능합니다.

유엔행복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민행복도가 낮은 이유를 경제적 요인 보다는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고 이것이 행복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물질적 토대에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한 전통윤리를 부활시키고 과소비문화, 고비용 결혼 문화 등을 근절하여 생활문화를 선진화하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들을 더 많이 만들고 분배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면 능히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물질이 아닌 정신적 풍요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2 차 서강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⑧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재환 (동아대 무역 2): 지금부터 제 2 차 동아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학령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에 따른 청년 취업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등 고등 교육에 닥친 위기에 맞서 무엇보다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전환에 무엇보다 '학벌주의'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진화를 위한 학벌주의 타파 방안'에 대한 주제로 각자 자유롭게 본인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수 (동아대 무역 1): 저는 무엇보다 교육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교육의 효율성과 결과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지나친 '주입식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교육 선진국들을 보면 개인의 창의적 소질 개발을 우선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주입식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의 개성보다는 '성적'이라는 지표로 모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주입식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를 위한 단순 암기식 수업이나 이론 중심의 수업보다는 교육 선진국들처럼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과 학습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이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동기부여와 분명한 꿈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주영 (동아대 무역 1): 저는 학벌주의가 지나친 대학의 서열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교를 가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대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실패자라는 인식도 같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높은 서열에 가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반대로 서열에 낮은 대학교를 가게 되면 그에 따른 패배감과 상대적 박탈감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방안으로 저는 비명문 대학 졸업생에게 수능 시험 이후에 여러 가지 기회에 거쳐서 자신이 노력한 능력 개발의 결과를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주의 타파!

김현주 (동아대 무역 1): 저는 학벌 그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학벌의 중시로 인한 폐해를 어느 정도 줄이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발언자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소유한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체제나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남진 (동아대 무역 3): 저는 학벌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벌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벌에 지나치게 목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체들이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제도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력이 낮은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환(동아대 무역 2):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개인의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⑨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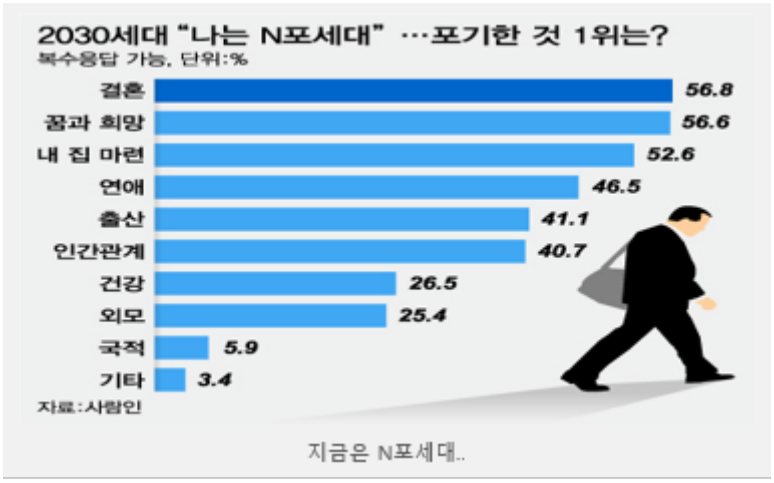
정승훈(단국대 철학 4) : 지금부터 제 2 차 단국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본주의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정신적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소 외국에 대해 부러웠던(본받을만한) 삶의 태도나 문화제도적인 측면 및 우리나라가 필요한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훈(단국대 전자전기 4) : 저는 우리나라에 여유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1700 여 시간을 일하고 한국은 2100 시간을 일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이죠. 따라서 삶의 여유를 갖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들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여유시간을 통해 자아성찰이나 반성의 시간을 갖고 대인관계에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유시간을 통해 사회적으로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노동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연(단국대 행정학 4) : 요즘 세대를 N 포 세대라고 하죠. 대학에 가면 연애도하고 전공공부, 여행 등등의 여러 가지 꿈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등록금의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여유도 잃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국내 한 대학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학생들의 자원봉사시간이 늘어나고 삶의 질과 사회적 책임감이 향상되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예와 같이 우리나라도 등록금을 없애거나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훈(단국대 철학 4) : 하지만 독일의 예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준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독일은 31%정도만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것도 중상위계층은 등록금을 두 배로 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죠

이상목(단국대 사학 4) : 저는 물질적풍요가 정신적풍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연결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물질적풍요를 일정이상 이루어도 끊임없는 욕심과 경쟁으로 정신적 풍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결과 삶의 질은 반드시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졌다고 정신적 풍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행복과 같은 정신적 가치는 지금의 한국 경제규모로도 가능합니다.

허슬람(단국대 철학 3) : N포 세대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취직, 연애, 결혼, 출산포기 등등 포기와 높은 자살률은 모두 민주시민의 의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과거, 경제적으로 재벌중심 경제를 했고 복지에 대한 의식 부족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타인을 뛰어넘기 위한 경쟁중심 사회분위기가 만연해있고, 타자의식으로 시민의식의 주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사회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공동체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으로 개인의 성공만을 중요시합니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넘기는 실태는 지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원(단국대 한문교육 4) : 제도적으로 독일의 마이스터공고가 부럽습니다. 취업률로 인해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적 문제는 높은 대학진학율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얻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 독일의 마이스터제도가 본받을만합니다.



취업특성화고인 마이스터고를 적극 유치하자!

독일에서는 5~6 학년 때 진로설정 및 탐색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조기에 개인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교육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취업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연(단국대 행정학 4) : 독일의 경우 대학의 교육비가 무료고 필요한 사람들만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현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고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은 다양한 사회적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자신의 학습능력에 맞는 대학을 가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야 합니다.

허슬람(단국대 철학 3) :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대학에 진학함으로 생기는 필요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꼭 대학이 고급문화를 접하는 곳으로 정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윤호(단국대 전자전기 4) : 산업에서 기술중심으로 흘러가는 현 실정에 대해 의문입니다. 기계화와 자동화의 물결 앞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즉 대학이 인문학 등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학과 선택을 할 때)적성에 따라 과를 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목(단국대 사학 4) : 문송합니다, 수저론 등 다양한 자조적이고 자포자기적인 현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지금의 산학연계구조를 개혁해야 할 필요도 보입니다. 학생들이 취업이 잘되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면 '우리도 잘 할 수 있다!'는 의식이 퍼지지 않을까요?

정민우(단국대 경영 3) :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지역 인프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과가 취업을 위한 장으로만 변질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스타성 있는 영역에만 지원하고 투자를 해서 단기적인 이익과 이윤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인 학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합니다.

박태윤(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 4) : 현실적으로 인문학이나 기타 비실용학문을 공부해서는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취업의 준비하는 공간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이죠.



취업 신조어가 된 '문송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산업이 고용유발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분야에 젊은 인재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를 신설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MF 이전까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현실이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수경제순환 실패가 첫 번째 요인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하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있죠. 두 번째는 복지의 문제입니다. 복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동욱(단국대 경영 4) : 복지의 전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란 한 계층의 기부로 이루져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김현중(단국대 법학 4) : 저는 공감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공감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요, 이것은 경쟁의식의 과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한경쟁으로 인한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팽배해있고, 이로 인해 다양성 존중과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일정의 보상을 통해 경쟁의식이 과열된 현 실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승훈(단국대 철학 4) :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역시 청년세대의 의견답게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 복지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이 '공동체 의식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면서 제 2 차 단국대 선진화 연구모임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⑩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주아람 (건국대 경제학 4): 지금부터 건국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연구모임에 참가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헬조선'과 '수저계급론' 등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갈등수준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잠재 성장률 저하와 사회 갈등을 잠재우며 바람직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선, 먼저 정신적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즉, 물질적 성장만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진정한 풍요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고, 인간성의 회복과 실사구시 정신이 바탕이 된 절제사회가 바로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명 '눈칫밥' 주는 비효율적인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저는 현재의 경제 수준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수준인 '잠재 행복 수준'으로 도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일과 삶의 균형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일과 삶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로 기준법이 지켜지고 있는 사업장은 드물며, 이에 따라 잦은 야근과 초과 근무는 어느덧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것도,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같은 맥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 문화와 환경들을 개선하고자, 기업 자체 내에서도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와주어야 하고, 근로자 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학우 분들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잦은 야근과 회식은 저녁 없는 삶의 주범이다.

김가은 (건국대 경제학 4): 잦은 야근과 반강제적인 회식은 우리에게서 저녁이 있는 삶을 앗아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들입니다. 일명 '칼퇴'를 일삼으면, 주어진 근무 시간 내에 업무 처리를 잘 하는 효율적인 직원보다는 눈치 없는 직원으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모두 마무리하여 칼 같이 퇴근하는 일을 왜 우리는 상사 눈치를 보아가며 행여나 불성실해 보이지 않을까 늦게까지 회사에 남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을까요? 만약 근무를 오래한다고 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모두 어마어마한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길어져야만 실적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택근무와 유연한 근무시간을 가진 기업 환경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상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혁신적인 기업들의 기업 문화는 효율성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상사 눈치를 보며 야근을 일삼는 문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은서 (건국대 경제학 4): 맞습니다. 예전에 어떤 설문에서는, 상사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할당된 업무를 다 끝내지 않고 야근하면서 할 일거리로 남겨둔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직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선 기업 환경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추가 근로나 야근 수당 지급이 확실하게 잘 되도록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눈칫밥 주기 식의 야근, 회식 문화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묵적인 사업장 문화는 단 시간 내에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따라서 사내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근무시간만이 능사는 아니며, 오히려 주어진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끝마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백민희 (건국대 응용통계 4): 저도 모두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눈칫밥 문화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눈칫밥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우리 청년들이 중소, 중견기업, 더 나아가 '기업'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더욱 더 몰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공공부문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그저 안정적인 삶과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지고자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업무 질도 떨어질 것입니다. 일명 무능한 '관피아'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정도로 큰 비효율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녁이 없어 점점 소원해지는 가족 관계.

김은서 (건국대 경제학 4): 또한, 저녁이 없는 삶은 가족 간 유대 저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8 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가장 짧았습니다.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스스로를 '돈 버는 기계'로 칭하며 가족들과 소원해져 점점 고독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고 항상 늦게 퇴근하는 아버지와 나누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유대감을 잃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윤리 의식의 결여는 향후 노인 부양 문제로 직결되어 부모님을 방치하는 현대판 '고려장'과 '독거 노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거 노인들은 점점 더 궁핍한 생활 속에서 고통 받으며, 가족들에게 버려졌다는 큰 상처를 가슴에 안고 정신적으로도 궁핍하게 살다 쓸쓸히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녁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은, 개인과 그의 가족들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주아람 (건국대 경제학 4): 네, 또한 이는 많은 유능한 인재들을 유출시켜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작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한 첨단 벤처 사업장에서는 필요한 인재들을 구하지 못하게 되고, 청년들은 극심한 공무원 시험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나눔을 통해 여가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구축하자.

오재선 (건국대 경제학 4): 일자리 나누기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업 업무 할당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존 직원들의 업무량을 과중하게 늘리기 보단 일자리 나눔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자리 나누기는 개인의 인식 변화도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주어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저녁 시간을 자신의 정신적 행복을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휴식과 사색, 그리고 취미생활의 시간으로 만들어, 이를 통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재에 만이 아닌 예술 문화 사업과 인문학 교육, 레저 등의 경험재에 대한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경험재를 통해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고, 물질주의 문화가 팽배하고 속물적인 소비 행태가 일반화 된 우리나라가 절제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경험재 위주의 문화, 레저 생활을 해야 한다.

주아람 (건국대 경제학 4):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러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기업의 눈칫밥을 주는 회식과 야근 문화를 없앰으로써 저녁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두들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 야근에 대한 사업장 자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되어 저녁시간이 주어진 개인도 스스로의 행복 수준과 정신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가와 휴식에 있어서 경험재 중심의 소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 모두가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화 과제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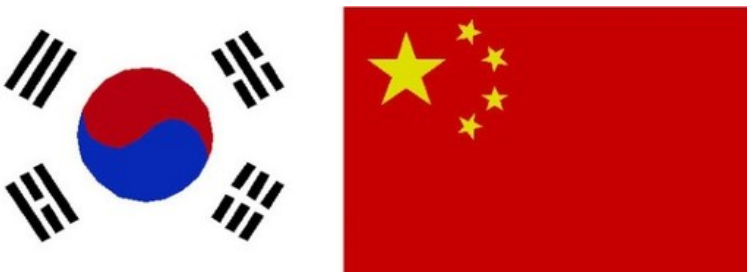
중국과의 FTA :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 62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김승현(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아직 한미 FTA 의 찬반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한중 FTA 라는 뜨거운 감자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과연 오늘날의 FTA 는 단순 무역협정일까?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접근해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FTA 는 혹자들의 의견처럼 국권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가 간 무역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국익'이다. 우린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한중 FTA 를 단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오늘날의 FTA 는 단순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수많은 쟁점 사안이 연계되어있는 부분이 무역이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안보, 환경,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협력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날의 FTA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라는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특수한 요인을 사이에 두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화된 관점으로 한중 FTA 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날 중국은 G2 로 대표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시장의 규모는 이미 미국을 초월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무역이 주된 이익창출 수단인 한국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세계제일의 소비시장이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부존자원도 없이 단기간에 집약적 경제성장을 달성한 우리의 경제구조적 특성상 수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상황이다. 스스로 문을 닫고 겁을 먹는다면 결국 한계에 이른 내수시장 속에서 경제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국가 간 협정은 갈등과 줄다리기가 필수적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각의 행위자인 국가들이 국익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자국에게 유리하고 모든 부분이 앞서는 국가간 협상은 존재할 수 없다. 국내적 협의와 타협을 이뤄내고 미진한 협상요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면서 완충적 협의가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한중 FTA 도 양국에게 각기 다른 쟁점부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리 걱정하고 반대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민관이 소통을 통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걱정하는 상황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며 최고의 협정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의 내용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중국보다 고차원적 산업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빠르게 기술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상황을 볼 때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은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촉매제로서 한중 FTA 가 빠르게 타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3 월 20 일 오후 7 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경상대학 학생들이 제 62 차 월례토론회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석원 경상관의 세미나실을 대관하여 토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모인 이후 가장 먼저 한국선진화포럼의 2 월 소식지를 배부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선진화 포럼의 주요 활동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진화 홍보대사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경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위해 제 62 차 월례토론회(한중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시청했습니다. 시청 후 스터디원들의 한중 FTA 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찬성 측

한중 FTA 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 스터디원들은 경제적 이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단 중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대국이므로 그러한 나라와 FTA 를 할 경우 우리나라가 얻게 될 경제적 이점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 1 차 산업 농산물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으나 그러한 것에 대해 브랜드화 그리고 특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더욱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FTA 를 통해 발생할 부정적인 면을 들추기 보다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FTA 로 인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욱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품 외에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으므로 거대한 중국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막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의견 외에 찬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대한 시장인 중국과의 FTA 를 통해 한국의 대내외적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란 말 때문입니다.

반대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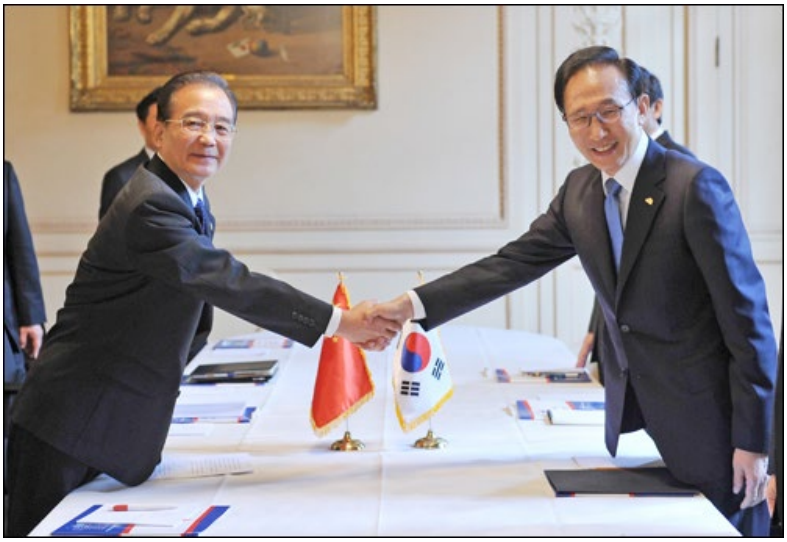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우선 1 차 산업 농산물의 막대한 피해 때문입니다. 아무리 브랜드화하고 특화된다고 해도 이 것은 예상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단지 추측만으로 일을 벌였다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게 만들 우려도 있습니다.





②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3 월 19 일 월요일 ‘경북대학교 선진화 연구 모임’을 결성하여 첫 오프라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 명으로 시작하려던 스터디가 갑작스러운 멤버의 탈퇴로 부득이하게 4 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2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동아리 후배 한 명을 급하게 섭외하여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한국선진화포럼이 무엇인지, 선진화 연구모임을 왜 하는 것인지 잘 몰라 입회를 망설이는 학우를 위하여 참관을 허용했습니다.



먼저 지난 월례토론회 동영상시청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진화포럼이란 어떤 단체인가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주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중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였습니다. 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는 주제로 토론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 어색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각자가 주어진 찬반 입장에 맞는 주장을 해놓았습니다.



찬성측. “개방이 살길이다.”

FTA 는 시대적 흐름이고 자원이 적고 인구가 많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무역을 진흥하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점차 대중 무역량이 늘어나고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등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좋은 조건으로 FTA 를 체결하게 된다면 국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이 한국과의 FTA 를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데 있어 향후 미래에 경제패권을 놓고 경쟁하게 될 미국과 중국 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자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한국과 칠레의 FTA 의 예를 들어 큰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인식시켰습니다. 또한 한국 농산물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오히려 중국으로 한국의 농산물을 고급화하는 전략을 거쳐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대측. “경제적 종속화, 다시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

반대측에서도 역시 대한민국의 경쟁력있는 무역강국을 만들자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과 칠레의 FTA 와는 다른,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와의 FTA 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과 멕시코의 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급속한 후퇴를 예로 들어 중국과 대한민국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들과 마주할 수 있다는 점, 미래 농산물에 대한 자원무기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의 식량 무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한-중 FTA 는 단지 경제부분에서만의 통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이 중국과 FTA 로 가까워질 경우, 사상이나 안보 같은 경제 문제와는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중 FTA 보다는 사안에 대한 대국민적 논의를 거친 후에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한-중 FTA 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 모두 대한민국의 입장에 섰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대한민국이 무역을 진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성측에서는 FTA 추진을 조심히 하자는 반대측의 입장을, 반대측에서는 한-중 FTA 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 많은 이익이 있다는 찬성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농업 분야에 대한 FTA 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팽팽했고 논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빚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서로 몰랐던 내용에 대해 좀 더 알아볼 수 있었던 점, 토론이 익숙하지 않은 요즘의 대학생들에게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처음 어색했던 시작과는 달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다음 토론에는 서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는 기분 좋은 다짐까지,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③ 전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전남대학교 선진화 스터디 모임이 총 5 명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왼쪽시계방향으로부터 김봉성, 주송현. 최재원, 배상아로 구성되어있으며 매번 2:2 로 팀을 나누어 주제에 맞게 토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터디에 집중하느라 사진찍는 것을 깜빡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다 마친 후 급하게 찍은 몇 장의 사진만 건졌는데요. 다음부터는 중간중간 토론하는 모습, 동영상 시청 모습, 판서모습 등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팀이 이번 월례토론회 주제인 "한중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에서" 찬성입장을 담당하였고 오른쪽 팀은 반대입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찬성 팀에서는 안세영교수님의 강연을 바탕으로 논리를 펼쳤는데요. FTA 는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흐름이며 우리한국에 있어 대중무역의 비중은 높기 때문에 이번 FTA 의 결과로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이룰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상 많이 팔아야 경제적 흑자를 거둘 수 있으므로 세계최대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요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한중 FTA 반대측을 향해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한미 FTA 의 경우에도 관련 산업 전문가의 말과는 달리 여론의 반응이 너무 부정적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 자동차와 관련해서 반대의견 측이 우리나라 자동차부분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 수입차 및 국내차 딜러들이 판단하기는 서서히 관세가 철폐되어도 우리나라에게는 이득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찬성 측 입장은 한중 FTA 를 포함한 다양한 협정에서의 관련산업 전문가들의 경험이 축적된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반대측이 내세우는 이론에서 농협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거 같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반대 팀은 국민 전체에게 효용이 증대되느냐?를 포커스로 반대입장을 펼쳤는데요. 제조업이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맞고 GDP 의 상승을 부축이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부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FTA 가 되면 수혜를 얻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 만이 혜택을 얻지만 이것이 사회전체적 효용으로 분배 될 수 있느냐 였는데요. 이는 계층 간 빈부격차를 더 유발할 것이며 사회불안감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이에 정부에서 수혜기업들에게 일정수익을 거두어 비혜택자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를 추진하거나 농업근로자들이 다른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반대 측이서는 사기업은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현실성이 있는가? 라고 반발하며 우리나라의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자리잡기에는 멀었다고 말하며 이상적인 발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농업대신 다른 직종으로 지원해준다고 해도 농업을 평생 업으로 삼았던 다수 농민들의 슬픔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라고 하였습니다.

스터디가 진행되면서 본 토론인 '한중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를 더 넓은 측면에서 분석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예정되어있던 시간을 20 분이나 초과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같아 좋았습니다.

④ 청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3 월 14 일 수요일, 개강 이후 '선진화 Study'를 결성하여 첫 오프라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재학중인 청주대학교에서는 6~7 명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선진화 Study 1 차 활동의 주제는 '제 62 차 월례토론회 : 중국과의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를 가지고 기회의 부문과 우려의 부문으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국과의 FTA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 동아시아 주도권 싸움



중국과 미국은 많은 다른 나라들과 FTA 협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FTA 를 조속히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두 강대국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FTA 가 체결되면서 중국은 더더욱 우리나라와 FTA 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특히 농산물의 경우 피해가 확연한 상황에서 쉽게 FTA 를 바로 보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우리나라는 작은 영토, 적은 인구,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무역의존도도 70%가 넘는다고도 하고, 칠레와의 FTA 를 보면 실제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피해볼 줄 알았지만 우리가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과의 FTA 특히 부각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반미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나 제조업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들 등 그에 대한 피해 역시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세계화의 추세다 : IT,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역간 차이도 점점 해소되고 있습니다. 역시 FTA 도 세계화의 추세인 것 입니다. 우리국민 누구나가 싼 값에 물건을 사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역자유화가 세계의 흐름이 듯이 우리도 그 흐름에 따라 FTA 를 체결함으로써 우위를 점해야 할 것입니다.



- 수산업 부문을 보면 우려가 깊다 : 선박차이에서도 우리는 중국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수산물 생산량에서도 우리나라는 300 만 톤, 중국은 5100 만 톤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로 수입하는 의존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수산물 시장에 많은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촌을 보면 노령화가 지속되어서 이제 수산물 시장의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쟁력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 made in china : 예전에 미국의 한 교수가 가정집에서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산 없이 며칠을 살 수 있는가 하는 흥미로운 실험이었는데요, 과연 며칠을 살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옷, 신발, 가전제품, 먹을 것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미 우리생활에 중국산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식량의존도, 대외의존도, 또한 에너지문제도 우리는 자급자족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FTA 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중간수준 : 우리나라는 특히 농업분야가 매우 민감합니다. 쌀뿐 아니라 특히 이 양파나 고추, 마늘 등이 더 타격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낙후된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부문은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중국시장 선점을 통해서 FTA 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EU 와의 높은 수준의 협상보다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부분은 확실히 보호하면서 중간수준의 FTA 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협상이나 절차 면에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경제뿐만이 아닌 북핵같은 안보문제나, 역사,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 상황들이 겹쳐있습니다. 신중한 FTA 를 통해서 중국이라는 퍼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우려만이 아닌 세계 무역자유화의 흐름인 FTA 를 통해서 국가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선진화 과제 30:

증세없는 복지의 과제:

복지의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

(제 78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강명재(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요즘 '복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문제가 대선을 거치면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한 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세 가지의 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증세없이 복지비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①비과세 감면 조정, ②지하경제 양성화, ③지출에서의 구조조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으로도 135 조원이라는 막대한 복지비용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최근의 발표에 따르면 이 세가지를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 조달가능한 금액이 복지비용의 목표치인 135 조원의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결과입니다.

또한 ①비과세 감면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②지하경제 양성화와 ③불필요한 지출방지는 사실 과거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실행돼 온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에 이르러서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적이지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중에 전기요금과 담뱃값 인상이 있는데 담뱃값 역시 현행 2500 원에서 4500 원으로 늘렸을 경우 걷어들이는 총 금액이 60 조원 안팎으로, 135 조원이라는 목표치에는 한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지금의 복지열풍은 이제까지 억눌려 왔던 복지에 대한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성장모델을 모방하며 한강의 기적의 쾌거를 일굴 당시에는, '나누는' 것에 관심을 쏟기 어렵고 하루빨리 성장하는 것이 목표였었죠.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 궤도를 그리고 있고 생활 여건이 풍족해지면서 복지에 대한 갈증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더구나 향후 2~30 년 안에 잠재성장률 1% 미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장기적인 성장요건을 위해 복지가 필수적인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고령화 사회문제와 여성인력 고용의 문제 역시 장기적인 성장에 적신호를 주는 원인입니다.

특히 여성의 대학진출 비율이 남성의 그것을 추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는 국가 및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겠지요. 복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며칠 전 기초노령연금 축소발표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서 다시 한번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세없는'이 수단이고 '복지'가 목표일 터인데, 복지 확대가 시대적으로 당면한 국가적 과제라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을 수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증세없는' 것에 현혹되어 큰 가치를 잃는 것 같습니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정부의 역할이 이제 더욱 더 중요해집니다. 충분한 연구조사를 동반하여 복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시급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이 얼마 정도이므로, 어느 정도의 증세를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증세가 확실시된다면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과 교감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공짜점심은 없다'와, 복지는 자신을 위한 장기적인 보험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부의 복지 방안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② 김영재(삼육대학교 경영학과)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종전 직후, 가슴 아플 정도로 가난했던 한국은 더 이상 굶지 않고 후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여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실을 맺었지만 그런 노력과는 반대로 복지에 대해선 그저 배부른 소리라고 치부하며 등한시 했었습니다.

그 시절의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들은 지금의 한국에 양극화 심화, 양성불평등,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인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정책이 우수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도 스웨덴을 복지의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걸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아닙니다.

한국은 언제든지 통일을 대비하여야 하며 막대한 통일비용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속도는 5 배 이상이 빠르며 또한 경제적으로 침체기에 빠진 한국이기에 스웨덴 따라잡기 식이 아닌 우리 한국만의 복지정책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한국형 복지, 어디로 가야할까?

그렇다면 한국형 복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기초생활비나 육아비와 같이 현금급여 중심의 복지였던 것을 이제부터 서비스 중심의 복지로 변화시킨다면 고용 창출로 인해 침체기에 빠진 경제 성장의 효과와 복지의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자들 중 근로능력이 되는 대상자에 대해선 먼저 취업을 지원한 후 생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근로능력이 되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초생활비에 의존하는 경향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형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자유엔 책임이 따르듯, 복지에도 그만큼의 부담이 따릅니다. 스웨덴의 고부담 고복지를 통해 알 수 있듯 우리가 복지를 누리기 위해선 그만큼의 부담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국민들도 복지를 위해 그만큼의 부담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세금을 올렸을 때 단기간에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거세게 반발할 것이며 복지정책 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민의 세금을 한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소득 상위계층 국민의 세금부터 우선적으로 증세한 후 단계적으로 국민 전체의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국민들의 반발도 줄이고 복지에 대한 신뢰를 줌으로써 복지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단계적인 증세를 통해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성장만을 외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른 나라를 따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서비스 중심의 복지와 상위계층부터의 단계적인 증세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형 복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③ 김우갑(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노인을 위한 복지, 기초노령연금

최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 관련 뉴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초 노령 연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65 세 이상 노인 인구 전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기초노령연금을 65 세 이상 노인 인구 100%가 아니라 현행의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은 공약 폐기 또는 후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비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공약이란 대통령과 국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비판 받아야 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일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표에서처럼 기초노령연금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증세 없이 65 세 이상의 노인 인구 전원에게 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국가의 부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수혜 범위 확대 공약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 공약들을 증세 없이 이룬다는 것은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공약들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증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쉽게 증세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크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증세를 하지 않고 공약들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 두 번째 이유일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못 미칠 정도로 낮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 세계 15 위의 국가가 된 정도라면 이제는 증세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증세 여론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증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데 나서서 증세를 해달라고 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조세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세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여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세금을 올린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증세가 없으면 복지 정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세금은 납부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는 것을 정부가 잘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청회나 각 정부 기관별 SNS 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공청회의 경우 국민의 여론을 받아 들이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과 정보의 신속성이 높은 SNS 를 이용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정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각 정부 부처별로 SNS 를 이용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활발히 이용한다면 효과적인 홍보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국민 공청회와 SNS 등 여러 채널들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증세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면 증세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쉽게 증세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무(無) 증세에 얽매이다 보면 내걸었던 모든 공약들이 물거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無) 증세라는 것도 여러 공약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無) 증세라는 공약 하나를 지키기 위해 여러 공약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무(無) 증세 공약 하나를 포기해서 여러 공약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약 하나를 포기해서 여러 공약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에도, 공약을 보고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증세를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증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합의를 통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증세를 해나간다면 증세는 실현 가능할 것이고, 그 재원을 통해 복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④ 김재혁(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한국사회는 복지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 한국사회에서 복지 문제는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연일 복지와 관련된 소식들로 나라안이 떠들석한데요 . 간단히 설명하자면 , 다양한 복지공약과 정책들이 산재한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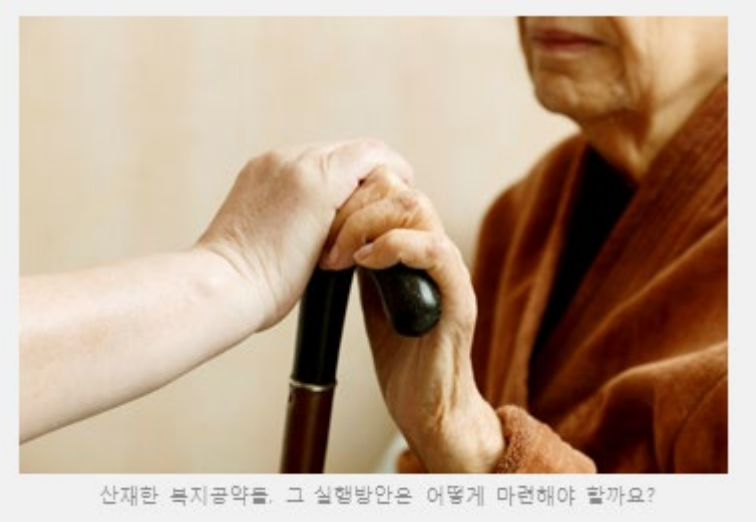
기초노령연금 , 4 대 중증질환 국가보조 , 무상보육 , 무상급식 , 반값 등록금 등등 너무나 많은 양의 복지 정책 공약 등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복지 정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 왜냐하면 , 이미 우리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작이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이죠 .

앞에 펼쳐진 길이 가시밭길이지만 , 이 길을 어떻게 잘 피해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정부는 현재 복지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으로 ‘ 증세 없는 복지 확충 ’ 이라는 명목 하에 재원 마련 확보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 , 지하경제 양성화 , 세출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문제는 이러한 방법 등이 재원 마련 확보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즉 , 현실성이 떨어지며 아랫돌을 빼서 윗 돌을 괴는 , 조삼모사의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



산재한 복지공약들, 그 실행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재원 마련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그렇습니다 . 증세가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죠 . 문제는 증세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

특히 국민들의 조세 저항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경제 생활에 더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와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은 조세 지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4 대강 사업이 있죠 . 엄청난 국비를 들인 사업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조세 지출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낮아진 수준입니다 .

그러나 , 국민들의 이러한 조세 저항과 조세 지출에 대한 낮아진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도출할 수는 있습니다 . 그 방안으로 저는 최소한에서 순차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리고 그 시작은 가진자들에서부터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지난 MB 정권 때 세율을 내린 소득세 , 법인세 , 종부세 등의 세율을 다시 원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로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기득권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 이것은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이러한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들의 투자위축이 생길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죠 . 이미 벌만큼 번 기업들은 많은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 즉 , 세율을 올리든 내리든 그들의 투자에 대한 선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

그리고 소득 상위 1% 계층의 소득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히 부의 집중 심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소득 재분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 특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미국과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

주목할만한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 가진자들의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 미국의 경우 빌 게이츠를 비롯하여 워렌 버핏 등 , 사회적으로 기득권에 위치하고 있는 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소득 재분배를 위해 나섰습니다 .

빌게이츠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부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 워렌 버핏의 경우도 부자들의 증세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나섰죠 .

반면 , 우리나라 가진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 낮아진 세율에도 불구하고 , 소득 재분배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보이질 않았죠 . 오히려 그들의 배를 더욱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진자들에 대한 부의 집중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것이고 부자증세를 역설하는 것이죠 .

그리고 이런 이유들이 국민들의 조세 저항에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선별적이나마 순차적으로 부자 증세가 필요한 것이고 이는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보편적 국민들도 증세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박근혜 정부는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 정치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정치적으로는 풀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이 사회의 가진자들 , 즉 기득권층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증세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워렌 버핏이 한 말대로 이 사회는 자신이 기여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능력주의 원칙에 의한 가진 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 즉 최소한의 부자 증세는 오직 부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부담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 부담률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보편적이고 선별적인 복지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

가진 자들의 증세 , 그리고 모든 이들의 보편적 증세를 통한 복지의 필요성 인식 제고는 현 시대에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인식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⑤ 김재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과)



9 월 26 일 박근혜 정부는 기존 공약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을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년, 중년의 국민들은 반발을 한 반면, 몇몇 청년들은 안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은 큰 부담이니까요. 청년들이 느끼는 노인복지에 대한 회의감, 바꿀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한국의 노인복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입니다. 10 월 1 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과 노인인권기구는 노인복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조사에서 한국은 39.9 점으로 OECD 에서는 꼴찌에서 2 번째, 전체 91 개국 중에서는 67 위에 그쳤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한국의 노인복지는 개선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복지의 재원을 마련해 줄 청년들이 복지에 대해 이렇게나 회의감을 가진다면 어려울 텐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그들이 회의감을 느끼는 원인에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출산의 증가가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이 노인복지를 꺼려하는 이유는 낮은 출산율 입니다. 연금을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반발을 느끼는 것은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입니다. 연금은 기부가 아니니 돌려받고 싶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만큼의 부양인구가 없다면 사실 이는 어려우니까요.

사실 이는 당연한 우려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2005 년 1.076 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정부의 출산대책으로 2012 년 1.30 명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출산 여성인구의 감소와 경기불황으로 다시금 1.1 명으로 후퇴했고 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출산율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웨덴은 남편 육아 휴직 제도를 사용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커리어에 많이 집중합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면, 이에 공백기가 생기고 보통 남자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며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동등한 공백기와 근무기회를 주어 그 극간을 줄여주면 여자가 출산에 있어 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한국사회에도 남편의 육아 휴직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남편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80%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육아휴직을 6 개월 이상하면 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게다가 3 년 이내에 둘을 연이어 낳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은 1990 년 1.6 명이던 출산율이 현재 1.91 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남편 육아 휴직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남자가 육아를 하면 이상하게 보는 인식도 많거니와 남자가 그만큼 쉴 경우 얻는 경제적 파장도 크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노인복지문제도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입니다. 고령화는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본인들의 임금 증가보다 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 수준과 연금수준은 그들로 하여금 노동에 대한 회의까지 들게 합니다.

실제로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가 9 월 30 일 통계청의 발표에서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르면, 2013 년에는 생산가능인구 6 명이 노인 고령자 1 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향후 10 년 안에는 생산가능인구 2 명당 고령자 1 명, 2050 년에는 1.4 명당 고령자 1 명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등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그만큼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도 누구나 예상할 결과지요. 따라서 생산가능인구의 이를 위한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이어 나올 세 번째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떨어져가는 취업률인데요. 오늘날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인 취업은 노인복지에 대한 불만을 증가시킵니다.

매경 이코노미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7.9%로 전체 연령 실업률의 2 배에 이릅니다. 즉, 본인 생계유지도 어려운 청년들에게 부양인구만 자꾸 늘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문제 모두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확대 입니다. 노령인구를 생산에 투입시키고, 그들의 일자리를 위해 청년들이 노력하는 것이죠. 이는 실제로 Enactus 라는 한 사회적 동아리에 의해 실현되기도 하였습니다.

Enactus 라는 동아리는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러 곳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을 비즈니스 리더로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입니다.

이 중 서울과학기술대의 Enactus 가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노령인구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컵 홀더를 제작하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컵 홀더였는데요. 이를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판매하는 것은 젊은 층이, 제작은 노년층이 담당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편적인 한 사례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2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교육수준과 한정된 직장인데요. 이 노령인구의 노동력과 젊은 청년들의 두뇌가 합쳐진다면 생산가능인구 연령층도 높이고 청년실업률도 줄어들 것입니다.

혹은 산업화를 이룩한 노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젊은이의 도전과 젊은 패기를 합쳐 새로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양상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 한국은 고령화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일류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활용된 다른 사례가 SK 사의 광고에서 드러났습니다. SK 의 광고에는 한 퇴직한 중년이 두 번째 첫 출근을 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 광고는 그 중년이 청년들의 사업에 조언을 주는 것과 같은 장면으로 마무리 되죠.

이처럼 중년 혹은 노년의 경험과 지혜로 만들어진 노하우는 청년들의 도전에 또 다른 촉진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인구를 청년들의 사업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개발시키고 파견할 수 있는 노인복지가 필요합니다.

이어 서비스 복지의 확대도 그 해결책 입니다. 서비스 복지는 현금복지가 가졌던 복지병이나 유럽병을 극복한 복지라고 하겠는데요. 이는 복지를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에게 의료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복지이죠.

이를 통해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도 실현할 수 있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연령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년 여성은 육아를 통해 육아복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서비스 복지도 또 다른 좋은 창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인식개선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흔히 노령연금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청년들은 육아복지와 같은 다른 세대는 얻지 못했던 혜택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이는 도리인 것이죠.

이에 더불어 노인복지는 잘만 활용하면 다시금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니 청년들은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모두에게 좋은 복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⑥ 김혜인(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양극화 현상이 복지에 대한 관심을 점화시켰다.

최근 정계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숱하게 회자되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지” 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대선에서도 복지 정책이 후보들 간 공약 경쟁의 핵심이었으며, 대중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 가는 추세인데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과 같은 문제들이 복지에 대한 관심을 점화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복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복지의 방식은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할까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의 답은 이러합니다. “인간적인 길을 따르라.”

그는 시장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인간성이 사라져 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관계를 꾸려 가며 정을 나누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무상 제공의 기본입니다.

철학적으로는 훌륭한 결론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과연 “모두”를 위한 무상 제공이 가능할까요?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무상 제공으로 표현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했을 때, 현재 한국의 경제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복지 정책의 효율성 또한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은 사회 구성원들이 부담하게 되지요. 이 비용은 주로 조세로 이루어집니다.

기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한다거나, 해외에서 차관을 도입하여 복지 정책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증세 없이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상 제공을 하다 보면 그 비용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필수적이지 않은 혜택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그 효율성 또한 낮습니다.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양극화 현상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분배”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복지가 필요한 소외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보편적 복지는 분배 도구로서의 기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두를 향한 복지는 다른 정책들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상 급식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정작 비가 새는 학교 건물은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복지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전반적인 삶의 질은 떨어진 것입니다.



복지를 통해 사회적 분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복지가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분배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세금 부담도 줄이는 형태의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를 필요로 함에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인간적인 길” 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⑦ 백주아(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 (星湖 李瀷)

혹시 이분을 알고 계신가요? 초상화의 인물은 조선 후기 실학자(實學子) 성호 이익(星湖 李瀷)입니다. 실학의 종장(宗匠)으로 불리던 이익은 투철한 주체의식과 비판정신과 더불어 개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며 많은 혁신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실학이란 학문은 본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궁극적으로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리의 정치를 중요하게 여기기에 여타의 사상들에 비해 실학은 '경제관'이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이익(李瀷)의 경제관은 안민부국(安民富國)이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 지기 위해서는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학자들은 국가 재정의 안정을 무엇보다 중요시했고, 국가 재정이 안정되면 백성도 자연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실학자들이 이룩하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닌 '복지' 였습니다.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가 이익(李瀷)의 서세 250 년이 되는 해인 만큼 그의 사상 중에 현재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복지와 관련한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증세 없는 복지'인데요, 경기 부진으로 국가 경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과 세금이 지척인 만큼 세금을 늘리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복지수요를 충당할 방법을 궁리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것들에는 바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과연 그 정도 수준으로 정부가 약속한 복지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익(李瀷)은 국가와 사회가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경제의 난기류로 인한 재정 적자 속에서 예산 분배 같은 예민한 부분에 대해 사회 각 부처별로 또 내부적으로도 복지 예산 마련과 관련한 의견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세출을 구조조정하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조세 정의를 확보하면서 우선적으로 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세수가 확보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 증대에는 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지요. 예전보다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미래 자신의 복지에 대한 투자가 이전보다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즉 당장의 증세는 피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증세를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에게만 부담이 전가되는 형평성 없는 세금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도 당신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데 마땅한 당위가 서지 않는다면 증세에 대한 적개심만 커질 것입니다. 증세에 있어서 우선순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조선 후기 재정난에 이익(李瀷)은 세금을 낮추는 것이 결코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토지세는 생산량의 약 5%정도였는데 토지 소유주는 양반지주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익이 주장한 증세는 토지세 외에 나머지 부역을 없애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세수를 살펴보면 토지세를 제외하면 일반 백성에게 부과하는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이익은 양전 사업을 통해 대토지주들의 토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토지세를 10%로 올려 양반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국가 재정난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죠.

약 200 년 전의 이익(李瀷)의 주장은 요즘 제기되는 '부자증세'와 상통하는 면이 많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복지 정책의 대안으로 기타 세금 보다 우선적으로 많이 가진 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부족한 국가 재정을 메운 뒤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증세에 대한 부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프랑스의 국민 배우 제라드 드빠르디유는(64) 부자 증세에 대응해 국적까지 포기했다고 하니까요. 토지세율 인상을 주장한 이익 역시 당시에 권세와 토지를 차지하고 있는 양반들에게 상당한 미움을 샀었습니다

부자증세 논의의 중심에 빠지지 않는 인물엔 이 시대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버핏은 “미국 중산층의 소득세율이 30%를 넘는 데 비해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17.4%밖에 안 된다”며 “부자들이 소득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정 적자에 시달리며 미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버핏과 같은 사회 기득권층이 발 벗고 나서며 부자증세를 외치는 모습은 점점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양극화라는 척박한 자본주의의 그늘진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느껴집니다.

성호 이익의 경제론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안민부국,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 재정 적자의 난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세의 정의가 구현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득권층들의 솔선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다고들 하죠. 여러 차원의 가치와 이해들이 복잡하게 얽힌 암중모색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구하는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복지를 위한 향후 증세에 관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투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 또한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⑧ 손계준(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사회는 '복지 논쟁'으로 말이 많습니다. 복지의 수준과 대상을 정함에 있어 정치적인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행복과 그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기 동안 경제발전을 이루고 탈 산업화 단계로 들어서며 인간의 행복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복지라는 개념도 수면위로 점차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복지는, 다양한 측면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복지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 년대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문제의 확대와 더불어 복지의 개념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복지에 대한 논의 또한 심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현금복지'에서 '서비스 복지'로 나아가자는 주장입니다.

서비스 복지란 기존의 현금급여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나아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더불어 여성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고용 창출형' 사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급여 위주의 복지 정책은,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근로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현금급여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제공을 하되 그들에게 건전한 근로욕구를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사회 서비스 복지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고무적인 것은, 현재 시행중인 노인들에 대한 요양서비스와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등의 제도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 년대 이후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과 가족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예산이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로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새로운 돌봄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 개발되었으며 방문형 재택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의 보편화와 양적 확대 추세에 더해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급격한 고령화를 먼저 겪었습니다. 급격히 증가한 노년층에게 단순히 금전적 도움을 주기보다 다양한 사회서비스 복지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했다는 의의가 있는데요,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의 비영리시민부분을 참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실제로 고령자들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자들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도 서비스 복지 제공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사회정책과정에서 민간복지단체를 자본가, 노동자 집단 외에도 공식적인 파트너로 개입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개신교 단체인 '디아코니아 센터'에서는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게마인샤프트'라는 가정 공통체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 사회동질감을 느끼고 연대의식을 갖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독일의 디아코니아 기관입니다. 이들은 '복지는 돈을 필요로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며 돈보다 더 필수적인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복지 시행 시, 공동체 가치의 지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서비스 복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현 상황에서, 이제는 더욱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의 늪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 계층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 복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보편화는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별성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잘못하면 '질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현실과 정책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회서비스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돌봄서비스 등의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공급주체로 인해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 제공측면에서의 '점조직화' 문제는 초기에 시스템을 통합관리하지 않는다면 향후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공급자 및 수요자 간의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조정관리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공동체적 방식의 서비스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특정 지역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데 지역 커뮤니티가 참여한다면, 일관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고 수요자와의 즉각적인 피드백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즉, 수요자인 그 지역의 공동체가 직접 참여해서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파편적 효과'와 같이 개인단위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맹목적인 복지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만족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독일의 '공동체 참여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입니다.

⑨ 송현지(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대통령의 거듭되는 사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복지 및 노인단체의 대통령 고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사건이 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위 사건들은 모두 '복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65 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 만 원식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65 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 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던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파기하는 것이기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 월 27 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하여 거듭 사과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대통령은 이날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과했고,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득상위 30%의 어르신들께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말아달란 부탁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기며 지난 30 일 사퇴했습니다. 지난 26 일 발표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30 일 사표가 수리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몇몇 복지 및 노인단체 회원들은 30 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찾아 박근혜 대통령을 '기초연금 공약 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박대통령의 공약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공약과는 달리 지원대상과 액수를 축소하여 노인들을 위와 같이 뿔나게 만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09 년 기준 45%에 달하고, 70 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 위입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들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을 위한 복지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조차 그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의 노인으로 제한하고,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게 되는 두 가지의 조건을 내걸어 공약을 파기한 것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노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를 세수부족 때문에 벌어진 불가피한 조치로서 공약의 후퇴나 파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조정이었다면 지급대상 노인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는 데 머물렀어야 했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까지 하게 되어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진 것이죠.

사실,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억눌려왔던 대한민국 복지 저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용수철처럼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복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서비스 복지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질병, 노령, 장애, 사망 등의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복지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앞서 기초연금 축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 복지에 대한 지출은 형편 없는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러한 현상이 유지된다면 고령화 시대에 노인 복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복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고령화시대, 웰빙시대를 위한 의료서비스복지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 월까지는 남아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보험 적용이 시행되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노인들의 부분틀니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틀니제작기간 중 식사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음을 고려해 임시 부분틀니도 보험 적용이 되며, 틀니를 끼운 뒤 3 개월간 6 차례까지 무료로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적용 대상은 만 75 세 이상 노인이며, 본인 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 만 9 천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현금서비스 복지보다는 위와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분야 서비스복지를 늘리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의 효과까지 기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현 정부가 추구해야 할 복지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질병, 노령, 장애, 사망 등을 위한 노인 의료 복지체제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 의료 복지체계를 갖추어나가는 과정에서 증세는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현 정부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기에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복지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와 증세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는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부의 재정 여건과 복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약을 일부 수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복지의

최우선순위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질병, 장애 등의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복지가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국가의 노인비율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대학생인 제가 걱정할 만큼 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한 복지체계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공약이, 특히나 노인복지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논의를 통해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체제를 갖추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⑩ 이동석(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지난 26 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 연금을 모든 어르신들께 지급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이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에도 금이 간 것은 물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무려 135 조 원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세에 대한 이야기 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줄곧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쳐왔습니다. 즉,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하지 않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수 부족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로 인해 대통령의 공약대로 증세 없는 복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째, 복지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반값 대학등록금, 4 대 중증질환 100% 부담과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약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말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 역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공약집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은 춘천~속초 간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은 1987 년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너나 할 것 없이 강원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해 왔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사업성은 들어가는 비용이나 수요를 고려한 것임을 생각해보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지도 않는 공약에 3 조원이 넘는 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경남, 북 내륙지방의 개발을 촉진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6 조 원 이상,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에 3 조 원 이상, 한려대교 사업에 1 조 3 천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말한 공약들 대부분 지방 SOC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대부분 대한민국이라는 국익이 아닌 지역 민원에 의해 시행하는 공약이기에 경제성 검증을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공약들만 잘 추려내서 걸러낼 수만 있으면 최근 일어난 기초연금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닌 복지의 우선순위를 따져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공약은 과감히 제외해야 합니다.

둘 째, 정부와 국민, 우리 사회에 대 통합, 공감이 필요합니다. 지난 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일 처리가 통하는 사회가 아님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증세 없는 복지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국민들의 조세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증세가 필요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국민 대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증세가 필요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해 우리 사회에 증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지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급하지 않은 복지공약은 줄이고 정부가 나서서 우리 사회에 증세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을 잘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⑪ 이승주(중앙대학교 경영학과)



대한민국이 3 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 경제적 생산성이 증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복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는 고학력 여성들이 육아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국가는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는 상호 win win 의 구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족한 세수에서 복지의 재원마련을 위해 소득 계층별로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복지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먼저 저부담 고복지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 부도 상태에 도달한 남유럽 국가들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즉 PIGs 의 경제 위기가 저부담, 고복지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 년 시행된 무상급식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를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인 서민들의 표를 의식해 재원이 부족함에도 추진 했었는데요 그 결과 재정부족으로 인해 학교 냉, 난방비 감축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재원이 부족한 마당에 아랫돌 빼서 윗 돌을 메우는 식의 저부담, 고복지인 복지 포퓰리즘으로 혹세무민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부도덕함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 방향이 잘 정해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복지를 하게 되면 실업자들도 구직 의지가 사라져서 자발적 실업이 늘고,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 증가 요인이 떨어진다는 '복지병'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이러한 복지병 해결을 위해서는 현금복지와 사회복지의 우선순위 조절이 필요한데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스웨덴은 왕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정도로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스웨덴이 복지 선진국이라고 보편적 현금복지인 그들의 모델을 무작정 따라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스웨덴 식의 보편적 현금복지를 하면 재원이 금방 고갈 될 것이며, 자발적 실업도 늘어 복지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복지의 속도와 수준을 조정하여 사회복지와 현금복지의 탄력적 활용이 끊임없는 국민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일반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⑫ 이효정(서울대학교 불어교육학과)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가 뚜렷하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 정부 최대의 과제는 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세제 개편에서도 나타났듯이 증세도 쉽지 않은 길임이 밝혀졌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뚜렷한 청사진을 찾아 보기 쉽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적인 복지라 하면 아무래도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누구나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복지국가와 늘 함께 연상되는 단어는 '복지병' 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복지의 형태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가장 이로울 지 고민을 해 보아야 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고용창출형 서비스(service) 복지입니다. 서비스 복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비스라니? 고용 창출형 서비스 복지라 함은 생산적 복지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국가들과 복지의 거시적 환경이 다름을 고려하고, 고령화 속도가 스웨덴의 경우보다 약 5 배 가량 더 빠른 것을 생각할 때 복지를 시행하면서도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성의 사회진출' 입니다.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선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출산 또는 육아 휴직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의 경제 활동을 멈추는 많은 한국의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 여성 직장인에게 출산 후 경제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앞선 스웨덴의 경우도 엘란데르 총리가 여성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탁아소와 보육원등을 지역적으로 추진하여 1995 년에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78% 가량까지 달성하여 당시 유럽의 평균을 훨씬 웃돈 결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 국가들에 비해서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활발하게 경제에 참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아동에 대한 복지가 먼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처럼 아동수당(만 16 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100% 국고로 지급한다)을 지급 등을 하여 제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복지가 더 이상은 포퓰리즘식의 정치에 흘러가지 않도록 국민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공정한 부담과 복지 수준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국민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⑬ 임성현(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지난 22일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2 일 박근혜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후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던 많은 유권자들과 국민들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기초연금 공약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략 중 하나였고 이를 위해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실행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이번 공약 철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공약의 철회는 아주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애초에 지키기 힘든 공약을 내세운 우리 정부에 문제는 있지만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고 이를 빠르게 판단해서 더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입히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정책은 반드시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계륵'이 되어버린 우리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흔히 많은 전문가들이 복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성공 사례로 북유럽 국가, 실패 사례로는 남유럽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이 두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에 실패한 그리스

우선 남유럽 국가들 중 복지 정책을 가장 실패한 국가로 그리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1900 년대 중반까지 국민소득이 세계 1 위를 차지하고 경제 성장률이 5%대에 이르는 부유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0 년대에 들어오면서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시작되면서 국가 재정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0 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더불어 그리스 경제도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복지 정책, 이 한 가지 요소 때문에 그리스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 정책에는 유사한 면이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노령연금과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는 이 두 분야에 전체 복지 지출의 80%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국가 재정이 바닥날 수밖에 없는 복지정책을 취했다고 할 수 있죠. 현재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기초연금이 이와 유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 그리스와 같이 복지로 인해 국가 재정이 바닥날 수 있었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남유럽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북유럽 국가들이 현재 지나치게 복지 정책을 써서 이른바 '복지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복지에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현재 이들 국가들은 성장과 복지를 모두 중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복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구조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2 년 부동산 거품 붕괴로 경제위기가 왔던 스웨덴은 그 동안 유지하던 복지 정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기초연금을 최저연금으로 전환하고 연금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등의 정책을 시행한 결과 1991 년 1%대에 머물렀던 경제성장률이 2000 년에 무려 4.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기준 스웨덴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4 위라고 합니다.

남유럽과 북유럽의 복지정책 사례들은 우리 복지가 나아갈 길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유럽 국가들과 같이 지나친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신 '일하는 복지'를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를 롤 모델로 삼아 복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일하는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재정건정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안정적으로 이러한 복지를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럽 국가들이 부도직전에 이르게 된 이유도 재정건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증세없는 복지', '65 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 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효과적인 복지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지체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⑭ 김광래(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등가교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비싸고 안 좋은 물건은 있지만,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것이 진리이고, 살아가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이다. 등가교환.

당시 천재 물리학자였던 뉴턴도 빠져들어 가사를 탕진하게 만들었던 연금술이라는 학문의 슬로건이었다.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재배치하여 다른 원소를 만든다니, 그럴싸한 이론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화학 이론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인풋과 아웃풋은 같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그 영악하다는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도, 돈을 번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나온다.

결국은 제로섬인 것이다. 그런데,이 시점에서 한 국가의 수장은 이야기 하고 있다. 인풋이 없이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다.

어디엔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아두고 공짜 이벤트를 한다며 약을 파는 야바위꾼들의 모습? 그럼 우리는 “저는 증세 없이 복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 그러신가요? 대단하시군요. 한 표 드리죠.”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소개되는 북유럽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의 세금은 매우 무거운 편이다. 그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키며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돕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왔다.



복지와 세금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물론 세금이 많아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부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돈이 많아 그것을 불법으로 바꾸려는 우리나라의 부자들과는 마인드의 차이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다.

작게 내면 작게 받는 것이고,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것이다. 그것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데, 이것은 보통 퍼센트로 들어가므로 많이 가진 사람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적게 내는 사람은 한 숨 돌릴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내가 생각하는 증세 없는 복지란 복지의 재분배가 정답인 것 같다. 복지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나라가 혜택을 베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상적인 논리이다.

만약 증세가 없다면, 재분배되지 않고서는 복지라는 말을 다시 꺼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가 증세 없이 재분배된다는 것은 부자의 혜택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을 말한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복지를 늘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들은 어떻게든 국가에게 기대길 원하니까.



형평적 복지 혹은 선별적 복지, 한국에 맞는 복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럼 지금 현 정부에서 생각하는 복지가 부자의 복지를 희생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말일까?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복지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세금이 덜 걷히거나 국가나 정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복지는 그 혜택이 크든 작든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돌아갈 때 뒷말이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헛된 이야기처럼 들리는 무상 급식도 만약 전체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행한다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 중 무상 급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두 무상 급식을 행한다면, 세금 사용의 비합리성에 대해 지탄을 받을 순 있겠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 무상 급식을 받으므로 그런 불만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난 보수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어쨌든, 정리하면, 정부가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결국 모순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증세 없이 복지를 말하기 위해 복지의 재분배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보수층의 이탈이 크며, 그렇다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비용이 너무 커진다.

둘 다 할 수 없는 형태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직접세를 올리든 간접세를 올리든, 국민 건강을 위해 뭔 짓을 하든 세금을 올리는 것은 증세이다. 다른 말로 교묘히 돈을 걷어가며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이다.

정부가 복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어떤 순위로 우선을 하든지, 혜택이 똑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같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혜택일지라도 말이다.

⑮ 김민정(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고령화 시대, 노인 복지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국가 재정은 더욱 부족한 현실입니다.

1990 년대 전체 인구의 5%정도였던 노인인구는 2012 년 11% 두 배 이상 늘었고, 향 후 2060 년에는 전체인구의 40%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노인 1 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15-64 세)가 2012 년 7.4 명에서 2039 년에는 2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퇴직 연령이 50대 중반임을 감안하면 노인 부양인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기업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50 세 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생산인구는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을 부양할 있는 수는 적지만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초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이 가장 높습니다. 노인인구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년연장과, 노인복지연금 등 다양한 방안을 내세우지만 이도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년을 늦추더라도 늘어난 수명에 대비한 충분한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는 힘듭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대비되는 저조한 출산율은 우리사회의 생산동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이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사회인으로 취급합니다. 퇴직자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대상으로 전락됩니다. 피부양인이 되어버린 퇴직자들은 부양인과 국가의 부담감을 늘려 우리 사회의 짐이 됩니다.

실제로 50 대 회사원 중 91%가량이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어했습니다.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은 해오던 일과 유사한 업무의 일을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의 수는 제한적이고, 향후 늘어날 고학력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노인 복지는 노인들의 남은 여생이 순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후원이 아닌 노인이 사회의 동력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오랜 기간 쌓아놓은 지식과 노하우에 젊은이들의 창의 혁신이 합해진다면 우리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⑯ 김수창(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여러분은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의 사전적 의미를 정의하자면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입니다.

즉, 국민 전체가 높은 삶의 질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를 위한 국비의 축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1 년 기준의 OECD 국가 종합복지지수 순위를 보면 1 위부터 5 위까지는 각각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가 차지했고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26 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한국 또한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말합니다. '한국도 이만큼 성장했는데 우리도 북유럽 국가처럼 학교 공짜로 다니고, 무상급식 같은 거 하면 안 되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OECD 국가 종합복지지수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과 한국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1 인당 국민 소득이 높고 낮다는 것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은 만큼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양도 어마어마하겠지요.

즉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복지를 위한 부담은 적게 하려고 하면서 북유럽식의 '고복지'만을 고집하며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27 년 후인 2040 년이면 한국은 일본에 이어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적은 세금으로 높은 복지를 실현하는 ‘저부담 고복지’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나’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저부담 고복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세 없이 높은 복지만을 누리려 한다면 결국 국가 재정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한 채 그에 따른 복지 정책을 제대로 추구하지 않다거나, 아무런 증세 없이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시행하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복지 정책은 물론이요 국가 체제 자체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세 없이 복지 정책을 추구한다면 현행의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증세를 하여 높은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 이 두 가지 중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앞서, 진정한 복지란 '나'만 생각하는 복지가 아니라 '후손'과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⑰ 김한결(강원대학교 일본학과)



온 세대가 복지를 갈망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8 월 중산층의 증세에 관한 뉴스에 많은 사회 갈등이 형성되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기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함께 모든 복지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끝날 염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무상교육. 고령연금 등 복지의 수요가 많아지고 복지를 갈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각종 복지정책은 현실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앞으로 다가올 유토피아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없고, 유럽과 같은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복지는 그야 말로 ‘꿈의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포기해야 할까요? 지금과 같이 현금이 위주가 되는 복지가 아닌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비스 복지란 기존의 연금과 같이 현금을 주는 복지가 아닌, 일자리를 개발하고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나아가 사회의 가치로 환원되어 경제성장의 일부분으로 창출할 수 있는 복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 산타클로스처럼 빨간 조끼를 입고 ‘안녕하세요! 잡지 빅이슈 입니다’를 외치는 모습을 본적이 있나요? 산타클로스가 아닌 홈리스(homeless)자립을 위한 잡지 ‘빅이슈’를 판매하는 홈리스 분들입니다.

잡지 ‘빅이슈’는 1991 년 영국에서 창간된 대중문화잡지로 노숙자라고 말하는 홈리스 가운데 자립의지가 있으며 판매원 행동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잡지의 판매권한을 부여하여 자활계기를 만들어주는 사회사업입니다.



노숙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빅이슈'

빅이슈의 시작인 영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데이비드 베컴이 재능기부를 통해 잡지 판매를 도왔습니다. 영국에서는 빅이슈를 통해 천명이 넘는 홈리스(주거취약계층)가 자립에 성공하였고, 이것을 본따 2010 년 우리나라에서도 빅이슈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빅이슈의 시스템은 홈리스에게 빅이슈 10 부를 무료로 제공한 뒤 권당 3000 원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수익금인 3 만원으로 빅이슈를 권당 1400 원에 구매하여 판매함으로써 1 부당 1600 원의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빅이슈 시스템 과정을 거치면서 홈리스의 자립을 돕는데요. 하지만 모든 홈리스가 빅이슈 판매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원 행동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자립의지를 가지고 있는 홈리스에게 자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제동과 많은 연예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빅이슈의 판매를 돕고 있습니다. 올해 3 년째인 빅이슈 코리아는 현재 누적 판매부수가 50 만부를 넘었으며,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까지 그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당역 3 번 출구에서 1 년간 빅이슈를 판매하던 한 홈리스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자립하였으며, 지금은 빅이슈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닌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가 되었다는 빅이슈 자활 성공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빅이슈 판매원인 홈리스들은 말합니다. "노숙인은 동정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동참'시켜야 할 사람으로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지를 위해 주어야 하는 것은 빵이 아닌 빵을 판매할 수 있는 '빵 틀'인 것 입니다.

최정은(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증세 없는 복지’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5 년 간 135 조 원에 이르는 복지비용을 비과세 감면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조정으로 마련하여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요즘, 국가의 재정 적자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여 국민들의 질타를 받으며 복지공약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가운데 박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포퓰리즘에 불과했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의 지지도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더욱 거세질 것이며 이미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지난 세제개편안 논란을 통해 얼마나 확고한 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결여된 공약시행을 위한 앞으로의 증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공약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실현에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자 했던 공약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시행한다고 해서 지속적인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언젠간 증세를 통해 복지가 이루어 질 것인데요.

따라서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필요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35 조 원이 필요한 복지공약 시행을 위해 증세를 감행하는 것은 더욱 큰 정치적 신뢰도 결여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게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증세 없는 복지, 즉 135 조 원이 필요한 복지가 아니라 좀 더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복지 위주의 복지공약을 선별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선 공약에 준하는 수준의 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필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복지를 증세 없이 시행하여 국민들의 신뢰도를 장기적인 관점아래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공약 재조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선별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복지 정책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논란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생활에 더 필요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만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실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재정낭비나 비리에 연루된 모습이 아닌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으며 세금을 낸 만큼의 복지를 누리고 있음을 느낄 때, 증세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선진국은 국민들의 월급에 절반 이상의 세금을 내면서도 반발 없이 복지국가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 만큼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닐까요?

⑲ 이미연(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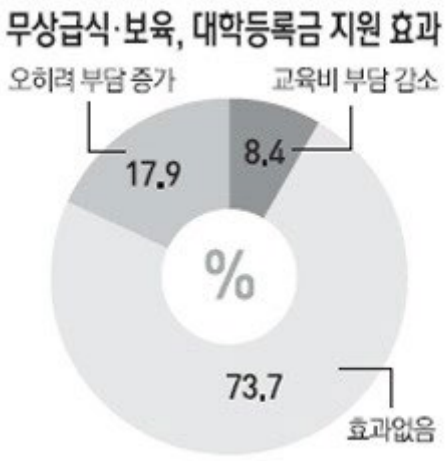
이번 상반기에 발표된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 분기 전국 2 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20% 계층과 소득 하위 20% 계층이 지출한 교육비의 지출 격차는 약 7.1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득 상위 20% 계층이 자녀의 교육비로 한 달에 약 40 만 7000 원을 쓰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소득 하위 20% 계층은 약 5 만 7000 원의 교육비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계 교육비 양극화의 격차는 2003 년 이래 10 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번 통계를 통해 저소득층은 생계유지 등을 위해 교육비를 줄이고 있지만 고소득층은 더 많은 돈을 자녀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득층은 교육비 지출을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저소득층에서는 교육비보다 식비 등의 지출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사회 계층 간의 격차'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끊임없이 대물림 되는 상황가운데 대물림된 가난이 교육을 통해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불평등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 나름의 여러 가지 시도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학생들에겐 정부의 지원이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빈곤계층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회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우리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던 중 루비 페인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일은 재정 자원보다 다른 자원에 더 좌우되며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관계'라는 주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가난이란 '한 개인이 자원 없이 지내는 정도'를 말하는데 자원의 범주에는 재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자원', '지적 자원', '영적 자원', '신체적 자원',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친구와 가족 등의 외적자원을 의미하는 '지원 시스템', '관계, 역할 모델', 집단의 암묵적 신호와 관습을 이해하는 가에 대한 '불문율 지식'등의 여러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가난은 돈보다는 다른 자원들과 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난이란 '재정 자원'의 측면에서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계층 간의 격차가 급격하게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계의 소득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과거의 사고방식, 사교방식, 인지 전략 등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나타나는 지적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정 자원 이외의 자원들은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교사 및 학부모가 교육을 통해 재정 자원 이외의 다른 자원을 아이들에게 지원하여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관계'라고 강조합니다. 빈곤층에 속했지만 중산층으로 잘 올라선 학생들에게 그 비결을 물으면 열에 아홉은 관계와 관련된 답을 한다고 합니다. 즉, 교사, 상담자, 코치 등이 그 아이들에게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기울이고 조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 빈곤층이 빈곤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사회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단지 재정자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 주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빈곤층 아이들에게 역할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이 만남은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서적 자원이나 노하우를 얻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관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에 대한 신념을 갖추고 각 분야에 수준 높은 실력을 가진 지도교사나 강사를 모집하여 학교가 해 줄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전라남도에 위치한 구례경찰서에서는 교수능력이 있는 대원들을 선별하여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을 해주는 열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를 받을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경찰서 대원들과 함께 공부하며 학업 성적능력도 향상되고 더 큰 꿈도 키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 별로 끼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업 향상을 위한 멘토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그리고 체육과 같은 교양분야의 역할 모델 역시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세습이 교육의 세습으로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환경에서 공부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빈곤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운명을 탓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은 자신의 선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아이들이 가진 본래의 잠재력 이상을 끌어내주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이처럼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되어 모든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채 련(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벌써부터 복지공약들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선거과정에서 내세웠던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 배 인상해 월 20 만 원씩 지급하겠다.' 공약은 대폭 후퇴하여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고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발표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보편복지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못한 채 이상적인 보편복지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게 된 꼴'이다.

지난 선거 때 이슈가 됐었던 '보편적 무상급식'은 현재 어떻게 되었는가? 무상보육이 법제화 되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재원 재정난과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계속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계속되는 보편복지의 실패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증세 없는 보편 복지'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편복지에는 보편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보편복지를 원한다면 그만한 세금을 내야하고, 결국 증세는 필수적이다.

이제는 우리가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모든 복지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눠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 복지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먼저 단기적인 시각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적 자원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에 집중하는 한편, 중산층 강화와 고용 창출형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우선순위를 두어 효율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하게 새어 나가는 세출을 줄이기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난 8 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0 년 이후 사망자 32 만 명에게 639 억 원의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등 지난 3 년간 총 4,000 억 원에 해당하는 혈세가 잘못 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복지정책으로 인해 불안정적이고 비효율적인 복지의 전달체계와 운영체계를 제도적으로 안정시켜, 세출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때이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단계적인 보편복지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덴마크, 핀란드처럼 평등한 복지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모두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부담도 모두 감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그림이 있다면, 모두 함께 세금을 부담하되 잘 사는 사람이 조금 더 부담하고, 모두 함께 복지를 누리는 대신 가난한 사람이 조금 더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번에 무리하게 진행되었던 복지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 지속 가능한 보편복지를 위해서는 복지 정책도 증세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두 가지의 속도가 맞아야 국민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정치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홍용남(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정작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 확대 논란으로 뜨겁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정부의 복지지출이 OECD 대비 확연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복지를 확대해야 해야 하는 시기라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듯 하다.

문제는 복지 재원이며, 부족한 재원으로 어떠한 복지 시스템을 확대할 것이냐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빚이 자그마치 1000 조 원이다. 일본과 같은 파괴적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내며 양적 완화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부족한 재원으로 어떻게 복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을까? 일부 세력들이 이야기하듯 4 대강에 썼던 예산만큼만 복지로 돌린다면 해결될 일일까? 그런 케케묵은 논란은 뒤로하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어떠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할 지 강구해야 할 때다.

누군가는 복지를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언제나 국가와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돌봐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관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 현재 국민의 희생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복지확대는 필요하고 예산은 없다. 경제 전문가들이 달려들어도 답이 나오질 않는다.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 맨큐 또한 한국의 증세 논란에 대해선 탄소세 등 부가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계가 인정하는 전문가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재벌과 대형 기업 위주로 대대적인 증세를 실시하여 세금을 모은다? 이 또한 부적절하다. 어디 우리나라의 법이 약해서 재벌들이 탈세를 하고 불법 상속을 했단 말인가? 어떤 강력한 법이든 재벌들이 법제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미국처럼 자발적으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부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빌 게이츠가 독점, 끼워팔기 논란으로 한창 질타를 받고 있을 때 빌 게이츠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빌 게이츠는 MS 회장직을 사임하고 오랜 친구이자 창업동료인 스티븐 발머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대거 기부하며 '기부천사' 이미지로 거듭 태어났다. 현재는 아이들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가르치겠다며 'Code.org'에 강사가 되기를 자처했다.

물론, 빌 게이츠의 그 많은 돈으로 미국 내 소외층들이 혜택을 받았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재벌 혼내주기식 증세 방안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증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벌을 아무리 짜내도 증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미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이해집단의 주장이 여론으로 위장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에게 무작정 증세를 강요할 수 없다. "보험에 들려면 보험비를 내야 하지 않느냐, 세금을 더 내라"라고 냉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국가의 GDP 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의 양극화는 확실히 진행됐다.

균형 잡힌 증세방안을 찾기 이전에는 복지의 단계적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재원이 없는데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달라, 실업 급여를 늘려 달라 등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전체주의 경계를 빙자한 이기적 행동이다. 그런 요구를 하는 자신들이 이해 당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의 행복을 국가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국가에 돌리고, 자식을 낳지 않는 이유를 국가에 돌린다면, 대한민국에서 살 이유가 없다. 떠나면 되지 않는가?

현재 중요한 것은 증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닌, 부족한 재원으로 어떤 복지를 '먼저' 시행할 것이냐에 대한 순서인 듯 하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은 정비될 것이고, 국민의 행복권도 높아질 것이다.

복지는 물론, 소외층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되어야만 한다. 중산층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소외층의 경우 어려움이 아닌 절박함에 가깝지 않은가? 그 시간을 못 참고 소외층이 받을 돈도 좀 나눠 달라는 주장을 내세워선 안 될 것이다.



절실한 학생들을 위해 반값등록금은 필요하다

실제로, 국가장학금의 경우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 정작 절실한 학생들에게는 금액이 다소 낮게 편성됐다. 물론, 장기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정부의 방향이겠지만, 이는 한 푼이 절박한 소외층 학생들에게는 참담한 소식일 것이다.

부모님께 등록금을 받는 학생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재벌가가 아닌 이상 부유한 집 자제들도 비싼 등록금을 부모님께서 부담하시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낀다.

중요한 것은 미안함을 느끼는 학생들보다 그 돈이 없어서 등록금 전액을 학자금 대출로 받아야 하는 절박한 학생들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안함은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며 효로써 갚아가면 되지만, 4 천만 원 가량의 빚은 고스란히 개인이 안고 가야만 한다.

증세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보다 이러한 복지의 우선순위가 공론화 되어야 할 시기인 듯 하다. 이후, 단계적으로 복지국가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최적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지만, 지금 당장 책임질 의무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손계준(서울지리3), 박의현(서울경제3), 이동한(서울경제3), 김성욱(서울경제3), 이동욱(서울경제3)

손계준(서울지리 3):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복지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복지문제가 정치적인 이슈와 결합하여 풀리지 않는 매듭과도 같아졌는데요, 현 정부에서 내건 복지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조금 더 수요자에 맞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현재 흘러가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께서는 현재 복지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동욱(서울경제 3): 우선 저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한계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째는, 복지가 다분히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 등 선거 때마다 보여주기 식으로 나오는 공약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공약들이 아무런 일관성이 없이, 그리고 이합집산이 되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복지정책의 실현가능성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시스템을 이루어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의 복지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시혜적 복지'에 치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혜적 복지만으로는 수혜자에게 어떠한 근로에의 동기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복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번 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욱(서울경제 3): 일단 복지라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현금 지급식 복지라고 해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비중을 줄여나간다고 할지라도 하한선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포퓰리즘 얘기에서도 계획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전체가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마음을 크게 쓰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수혜자조차도 자신에게 득이 될 사람들을 제대로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합관리를 하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책임 미루기' 식의 행정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동한(서울경제 3):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복지 자체의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의현(서울경제 3): 포퓰리즘 얘기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라는 것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자꾸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에 대한 논의도 포퓰리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계준(서울지리 3): 네, 여러분의 말을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포퓰리즘'의 성격을 띠고 있고, 시혜적 복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복지의 수준이 낮고 재원이 부족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셨고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욱(서울경제 3):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증세가 중요합니다.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자들도 자신이 소득을 얻은 만큼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인식이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를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복지 시스템자체가 스스로의 순환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혜적인 복지는 재원을 마련해서 그냥 주는 것이라면, 북유럽에서 쓰는 서비스 복지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계층이 일자리의 대부분을 채우게 되는 선순환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것이 일종의 재원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나면 세수도 늘어날 것인데요, 지역 공동체적 시스템을 보더라도 지역 내 '복지 센터'가 그 지역의 주도적인 산업과 협력을 하며 어떻게 하면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실업자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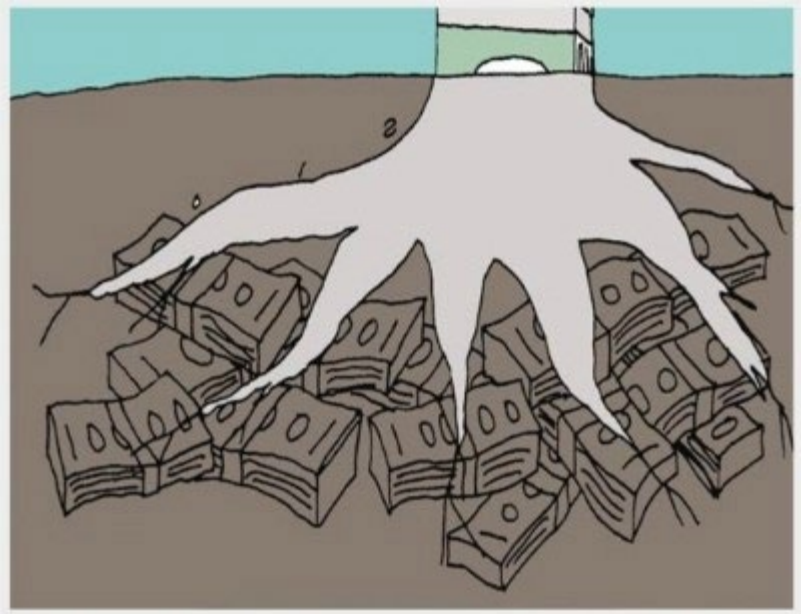
김성욱(서울경제 3): 제 생각에 '순환구조'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잘 되었을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운다거나 각종 경제 지표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시스템이 일자리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에게는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인 방안을 위해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세원'이 있어야 하는데, 예전처럼 토목공사 수준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것이 필요하고 정부 주도로 동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업은 나름대로의 일이 있으니 힘들 것 같고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궁극적 세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한(서울경제 3): 정부의 수입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한데, 현 상황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법인세 세율이 너무 낮은 것 같고 고소득자 소득세 탈세도 문제인데요, 기사에도 나왔듯이 기업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큰 것 같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탈세를 눈감아 주고 계속 반복하며 악순환 되고 있는 것 같고, 고소득자와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기 위해 국세청 주도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의현(서울경제 3): 우선 세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지도층의 비리에 대해 분노가 큰데요, 핀란드의 '노키아'사장이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을 100 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즉, 소득에 비례하여 벌금을 매기는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사회 지도층에게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식으로 정책이 마련된다면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결과적으로 증세 논의가 훨씬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계준(서울지리 3): 네, 제 생각에도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사회 지도층이 솔선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통합된 의견을 도출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의현(서울경제 3): 선별적 복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과 이미 대상으로 잡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욱(서울경제 3): 분야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 같기는 한데, 가장 큰 문제는 복지정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수혜자들도 그 정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제도 자체를 간소화해야만 선별적 복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혜층이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복지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히 알려줘야 나머지 사람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욱(서울경제 3): 이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상급식'인데요, 무상급식은 '가치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그럴 의미가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가 반영된 것에는 보편적 복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가치에 비해 비효율이 더 클 경우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를 시행 함에도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복지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한(서울경제 3):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별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걷을 세금을 차등적으로 걷고 혜택을 똑같이 주면 결과적으로 혜택은 취약계층이 더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등 재원 마련에 힘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와 동시에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계준(서울지리 3):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복지정책의 문제점부터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국가발전단계를 따져보아도 한국은 이미 복지에 대한 논의를 중요하게 해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오늘 연구모임의 결론은, 포퓰리즘으로 복지정책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현재 취약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출을 건전화해야 하며, 국민들의 통합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들의 관심과 복지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이효정(불어교육 2): 안녕하세요? 어느덧 두 번째 연구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모여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지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월례토론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우선 과연 복지국가라는 것이 성립되어 발전 해 온 이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본다면 현재 한국은 복지국가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인지, 역사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각자 미리 공부를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해요.

우선 짚고 넘어갈 점은 복지국가의 개념 정의겠죠. 사회과학에선 특히나 개념정의가 중요한데, 이는 허위 논쟁을 피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학자마다 매우 상이한 의견들이 대립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개념을 우선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복지국가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짚어 보는 것이 앞으로 미래 한국형 복지 국가의 성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복지국가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 왔는지부터 살펴 볼까요?

유예송(외국어교육 1): 우선 복지국가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의 경우 첫 번째 Esping-Anderson 에 의하면 liberal welfare state, 즉 빈곤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지닌 나라입니다. 한편 광의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가 증진되어 시민의 종속성이 완화된 나라라고 봅니다.

Romanyshyn 에 의하면 불우계층(the disadvantaged)에 대한 금전적 지원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나라인데, 광의적인 개념으로는 전체 국민의 universal needs 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복지정책이 마련된 국가입니다.

또 Mishra 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분화적-다원주의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와 경제 산업 및 공공분야가 분리된 형태로서 최소한의 복지급여나 서비스가 제공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광의의 의미로는 복지제공에서 국가가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Willensky&Lebeaux 의 정의는 residual welfare state 으로 복지제공에서 가족이나 시장이 기능수행을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복지를 해 주는 나라인데 광의의 개념은 사회복지가 경제산업 및 공공분야와 결합된 형태로 유지되어 모든 경제 정책의 성장과 분재를 동시에 지향하는 국가입니다.

강주은(아시아문명 1):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복지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다솜(불어불문 2): 제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이효정(불어교육 2):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개념상으로는 복지국가가 맞습니다. 다만,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보다 ‘나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를 발전 시켜온 원동력은 그것을 지지하는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론들에 대한 논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강수림(러어러문 2): 첫 번째로 이야기 해 볼 이론은 산업화 이론입니다. Wilensky & Lebeaux, Kerr 등의 학자들에 의해 지지된 이론인데요, 산업화로 인한 욕구와 자원의 창출이 복지국가의 발전을 이끈다는 이론입니다.

즉 산업화와 그에 따른 사회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한 것이 (대량실업문제, 산업재해, 빈곤밀집, 범죄, 노인인구 등)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RESOURCES 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조세부담 능력 향상으로 봅니다. 결국 경제성장이 복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셈이죠.

강주은(아시아문명 1): 그러나 단점도 존재합니다. 기능주의의 함정인데요, 욕구증대만 설명을 할 뿐 복지국가 제도의 근본적인 등장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유사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 중에서 서로 상이한 복지국가발전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독점 자본주의 이론입니다. 자본주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복지국가의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만이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보는 시각이죠. 네오맑시즘 지지자들에 의해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본계급과 국가 엘리트를 제외한 다른 행위자들은 철저히 무시한다는 점과 지나친 거시 추상성으로 증명이 불가하다는 점이죠.

유예송(외국어교육 1): 세 번째는 권력자원론입니다. 앞서 얘기한 이론들이 저개발국과 선진국 사이의 gap 은 어느 정도 기능주의적인 시각으로 설명 가능하지만 경제성장을 control 하기 위해서 선진국들간을 살펴 볼 때 각 국가의 diversification 은 산업화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대신에 설명 가능한 이론이 권력자원론입니다.

하지만 권력자원론은 계급간의 연대를 간과했습니다. 또 노조가 미약한 대부분의 초기 복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또 진보적인 이론 색채임에도 gender-sensitive 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효정(불어교육 2):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는데요 그럼 현 지점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다솜(불어불문 2): 복지국가의 발전은 매우 단계적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붉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인 '냄비근성'에 따라 지금의 관심이 한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복지국가는 제도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제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단순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복지제도에서 사회 서비스 복지제도로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어 본 적이 없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여성 노동자의 고용 창출 및 재취업 지원, 노인 인구의 취업 지원 등의 사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효정(불어교육 2): 오늘 저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한 복지국가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그에 대한 이론들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종합해 보면 정부에 의한 일정의 현금 보조 및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국형에 알맞은, 가령, 사회서비스 복지와 같은 제도들을 더욱 개혁하여 우리 식으로 맞추어 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엔 다들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살펴 본 이론들의 장단점을 취합하여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재고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②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동석(연세경영2): 그럼 지금부터 제2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복지공약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지난 26 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 연금을 모든 어르신들께 지급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이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저는 이번 복지공약 논란에 핵심인 1)*증세 여부와*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2-1)*증세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2-2)증세를 하지 않는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조은지(연세경영 2): 먼저 증세 여부와 관련해 말씀 드리자면 저는 증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출과 세입을 비교해본 결과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다 특히 사회 복지 정책의 경우, 나가는 돈의 액수가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 특성상 한 번 시작한 후 물리는 것이 어려워 지속적인 지출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세입으로는 복지공약을 시행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지금 일반적인 복지 공약과 관련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이번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에 한해서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조은지(연세경영 2): 네 저는 이번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에 한해서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란 말에서 포인트는 증세가 아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증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복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상(연세경영 2): 토론문을 보면 135 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복지공약을 증세 없이 이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재원 확충 방안인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이행하는 것이 힘들다는 부분에 있어 십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에 조은지 학우나 토론문의 경우 증세를 해서라도 모든 복지공약을 이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저는 공약을 선별해 가급적 증세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공약의 비현실성을 들고 싶습니다. 선거철에 내건 복지공약 중에는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야당 측에서는 무상보육, 급식, 의료, 반값등록금, 비 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내세웠고 여당 측 역시 비슷했습니다.

저는 이 공약을 보면 실제로 혜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혜택을 받는 무차별 보편적 복지 공약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공약이 아닌 진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공약들을 선별해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복지의 위험성입니다. 토론문을 보면 복지와 성장이 비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것이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룬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남미에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북유럽 국가들의 예를 보면 복지정책들로 인해 저(低)성장과 고(高)실업에 시달렸습니다. 더 이상 깊게 가지 않고 짧게 정리 하자면 복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정리해보면 첫째로 공약의 비현실성, 둘째로 복지 자체가 마스터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에서 궁금증이 생긴 것이 그럼 복지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건가요?

이규상(연세경영 2): 아닙니다. 복지공약은 자유시장경제의 맹점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장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복지의 경우 찬성하지만 너무 보편적 복지에 치우치는 경우에 한해서의 복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증세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기동(연세경영 2): 저는 먼저 증세 여부에 관해서는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증세 없이 공약 이행이 가능했다면 대통령이 사과하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이 된 이상 너무 쉽게 공약을 폐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관한 일종의 의무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민(연세경영 2): 저도 증세를 하자는 쪽입니다. 지금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국민들이 복지의 맛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70%가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고 합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국민들 역시 증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지금 의견을 정리해보면 한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세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얼마 전 세제 개편안 때 국민적 저항감이 상당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막상 정말 증세를 하게 되면 세제 개편안 때처럼 '지금도 살기 힘든데 왜 또 세금을 올리느냐' 와 같이 저항과 반발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무릅쓰고 정부가 증세를 단행한다면 박근혜 정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의 하락을 시작으로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해서 증세를 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보민(연세경영 2): 저는 먼저 증세를 한다고 했을 때 왜 국민들이 반발을 할까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가 잘사는 사람들, 기득권층은 세금을 많이 안내는 것 같은데 잘 못사는 사람들 세금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리고 부자감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증세의 경우 순차적으로 기득권층의 세금부터 올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전 정부 시절 내린 세율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세금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 대강 같이 막대한 돈을 썼지만 계속 문제점만 발생하고 정작 국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공약들로 우선순위를 정해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꼭 증세가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를 정해 모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증세 없이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은지(연세경영 2): 저는 우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공약, 필요한 공약이 모두 다를 것인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우선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여부를 떠나서 저는 복지공약을 올 한해만 이행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면 증세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 초기 힘 있는 지금 증세를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상(연세경영 2): 저 같은 경우 정권 초기인 지금 증세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 개월 전의 공약을 뒤집는 것을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공약을 만들 때의 진심을 의심할 것이라는 정부도 알기에 쉽게 증세를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증세를 하더라도 천천히 점진적으로 증세를 할 것이지 갑자기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에 증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세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그렇다면 지금 증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신데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특히 증세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규상(연세경영 2): 저는 무리하게 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지효율화,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개혁 등 가능한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여기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칼럼에서도 말씀하신 예처럼 춘천~속초 고속도로와 같이 사업성이 없는 공약들도 지역 민심 표 몰이를 위해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65 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무차별적 보편적 공약 역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린다면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복지공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 복지공약 관련 사태가 국민들의 인식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들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당이나 야당 모두 복지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남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상대편 당에서 내세운 공약을 우리는 공약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의 표를 잃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런 공약들을 내건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번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공약들이 정말로 모두 이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어두운 면인 것이고 그 것과 별개로 이번 복지공약과 관련한 문제들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아무리 다음 선거 때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도 앞으로 4 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복지공약이 흐지부지 이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복지공약이 표를 위한 필요 없는 공약도 있겠지만 일단 공약으로 내건 만큼 모두 이행하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기동(연세경영 2): 저는 일단 증세를 하자는 쪽이지만 증세 하지 말자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복지공약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복지공약 규모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보면 4 대 중증질환 100% 부담이라는 공약이 있는데 여기서 100%를 처음에는 20%부터 시작하는 쪽으로 생각해보면 꼭 증세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수정하는 것 조차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은 여전히 공약을 수정한 것에 대해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 역시 박근혜 정부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규상(연세경영 2):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약속을 끝까지 이행한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입니다.

강유진(연세경영 2):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공약들 모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을 이행할 때의 수단의 문제이지 공약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동(연세경영 2):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 거기다 좀 더 덧붙이자면, 복지공약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 아낀 돈을 다른 곳에 소비하는데 지출한다면 경제가 활성화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와 경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유진(연세경영 2):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등이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약이라는 주장에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럽 선진국에 경우처럼 그런 공약들은 누구를 위한 공약이 아닌 당연하게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역시 우리나라의 높은 부패 율, 중 과세 폐지 등 낭비되는 재정이 많고 기득권층에서 충분히 세수를 걷지 않는다고 보았을 때 충분히 모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꼭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공약자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폐기는 사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나 계속 있어왔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 공약을 폐기하는 것도 어떤 때는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이행의 문제가 아닌 공약의 필요성 때문에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동(연세경영 2):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나 미디어, sns 가 발달한 요즘 예전처럼 똑같이 공약을 폐기하더라도 그 것의 결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 가장 크게 내세웠던 복지 공약을 폐기할 경우, 그 소식이 언론 미디어, sns 을 통해 빠르게 국민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대통령이 입는 지지율 하락,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는 과거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민(연세경영 2):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과거에 흐지부지 된 공약들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애초에 그런 공약이 있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복지공약과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부터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덕분에 복지공약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할 때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과거보다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지(연세경영 2): 지금 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예 시작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괜히 거창한 공약들을 내세워 국민들이 한껏 기대하게 만들고서 갑자기 돈이 없어 공약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저는 증세를 했을 때 성난 민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저는 성난 민심과 별개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이번 복지공약 논란을 보았을 때 정부가 복지의 개념이나 공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일어난 측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공약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때 지금처럼 그냥 덮으려는 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어 얼마만큼의 돈이 부족한지를 설명해주고 앞으로의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달래는데 있어서 사회 서비스 복지를 가장 먼저 이행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공약을 먼저 이행한다면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에서도 보면, 사회서비스 형 복지를 하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반 감률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국민들이 더 빨리 '내가 복지를 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 실질적인 증세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 지방 분권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 분권은 경제적인, 지방 자치제 별로 재정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지방 재정에서 국고의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 나라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동(연세경영 2): 생각해보지 못했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방세를 늘려서 세수를 확보한다는 이야기 역시 따지고 보면 국민들의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은지(연세경영 2): 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증세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만약 증세를 한다면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저는 복지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의 공약 중에 각 지방별로 필요한 공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즉, 노인이 많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약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이 중앙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재정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가지 복지의 개념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라는 개념이 간단히 말해 '다 같이 잘 살자' 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잘 사는 국민들에게까지 왜 복지를 해줘야 하나 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골고루 공평하게 쓰인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자들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쓰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자들도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왜 나에게 오는 이득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하지' 라는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복지공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부가 국민들을 잘 설득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연세경영 2):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복지공약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모르던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선 대체적으로 증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증세의 방향, 증세했을 때의 부작용 해결방안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송현지(이대교육 2) : 먼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미리 메일로 초청장과 토론문을 보내드렸듯이 지난 9 월 26 일, 복지에 관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의 '증세 없는 복지의 과제 : 복지의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정부의 노인 복지공약 파기 현실에 적용하여 '고령화 시대, 더 이상 노인 복지를 미루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통해 한국형 복지모델을 추구해나갈 때 특히,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복지에 관해 말도 많고 앞으로도 복지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에 대해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박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65 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기초연금 20 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지난 9 월 25 일 갑자기 재정부족을 이유로 지급대상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해 노인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6 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듭하여 사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고, 복지단체와 노인단체가 대통령을 고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는 현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번 기초연금공약 축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 복지에 대한 지출은 형편 없는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러한 현상이 유지된다면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대통령의 '노인복지공약 축소'와 '증세 없는 복지 추구'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지선(이대교육 2) :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까지 공약 축소를 한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건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분들께서 많이 뽑아주셨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그 공약에 대해 들으시고 많이 좋아하셨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서 안타깝네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공약을 내건 것도 문제였고 뽑은 사람들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장서현(이대교육 2) : 사실, 노인 분들이 많이 뽑아주신 것은 맞지만 뽑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당연히 지킬 것이라는 전제 하에 내놓는 것이고 지켜질 것을 기대하고 뽑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믿고 뽑은 거죠.

이지선(이대교육 2) :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라도 진행시킬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선택이 맞긴 한데 문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결시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한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정치인들이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내걸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투표를 하고, 젊은이들은 정치와 투표에 많이들 무관심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식도 향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원(이대교육 2) : 사실 증세 없는 복지는 힘들 것 같아요. 복지를 하려면 어떻게든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증세가 불가피하겠죠. 증세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우리나라의 검은 돈들이 많이 양성화되어서 재원이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진(이대교육 2) : 세금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긴 한데 그것도 의식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세금은 안내면서 나는 복지를 받고 싶다 라는 것은 어폐가 있죠. 세금이 걷혀야 복지가 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 세금은 특히 부자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더 내려고 하지 않죠.

이지선(이대교육 2) : 증세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보험료 몇 백억씩 밀린 사람이 많다는 기사를 봤어요. 연예인도 한 명 있었고 하던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의 밀린 세금을 걷는 것도 시급하구요.

그런데, 다들 세금을 안 내고 버티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낸 만큼 돌아 오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건 복지 정책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는 국가에서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좀 강력하게 복지공약의 실천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서현(이대교육 2) : 그런데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도 모자란데 그 반대로 현재 공약을 파기하고 축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죠. 노인 분들의 실망은 더 크셨을 것 같아요.

송현지(이대교육 2) :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인 저희들 뿐만 아니라 노인 분들께서 이번 공약 축소로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한국의 노인복지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박노원(이대교육 2) : 읽어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복지가 매우 열악하다고 나와있어요. 노인 빈곤율도 높고, 노인 자살률도 높은데 이것이 복지와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간 우리가 노인이 되는 미래에는 노인복지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어진(이대교육 2) : 우리나라가 노인들을 위해 국가의 돈을 안 쓰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되어가는 속도도 다른 국가보다 빠른 상황인데 말이죠. 노인연금처럼 20 만 원씩 매달 현금을 주는 것보다 사회서비스 복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지(이대교육 2) : 네, 노인들한테 돈을 직접 주는 것 말고 노인 고용을 장려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노인복지를 위한 하나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률도 높이고 노인들의 은퇴 후 내적 성장에도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서현(이대교육 2) : 저 역시 칼럼에서처럼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수명은 길어졌지만 그만큼 더 오랜 기간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니까요. 스케일링 연 1 회 무료나 부분틀니 보험적용과 같은 의료복지지원이 좀 더 확대돼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선(이대교육 2) : 최근 할아버지들께서 아파트 경비 쪽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굳이 젊은이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의 일들은 좀 더 노인 분들이 일하시기 좋은 환경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해요. 요즘 노인 분들이 아이 돌보미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 일은 사실 젊은이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장서현(이대교육 2) : 그래서 일자리 자체를 늘려야죠. 현재 있는 일자리만을 가지고 밥그릇 싸움 하기보다는.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것처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아요.

이지선(이대교육 2) : 굳이 일자리 만들지 않아도 잡쉐어링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시민의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현지(이대교육 2) : 교육학과로서 노인복지의 한 가지 방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노인들을 평생교육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원하는 교육을 받고 자아실현을 돕는다면 노인 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고 고용되는데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이어진(이대교육 2) : 평생교육이라는 건 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하죠. 즉, 학교에 다니는 연령 이외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는 모든 교육형태를 아우르죠. 이것을 노인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노인복지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평생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아이들에게 멘토링의 형태로 전달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준다면 노인 분들이 일정연령이상이어서, 혹은 소득 분위가 어느 정도여서 무조건 현금을 지급한다는 방식의 현금복지보다는 훨씬 생산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선(이대교육 2) : 그런데 그게 청년들의 국비지원무료교육과 형태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런 형태의 국가지원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해요.

박노원(이대교육 2) : 동의합니다. 평생교육 할수록 교육수준만 높아지고 여전히 일자리 수요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멘토링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 수업 하는 교사들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던데 그 자리에 체력적으로 건강한 젊은이들도 일하기 힘든데 현실적으로 노인 분들이 일하시기 힘들지 않을까요. 또한 제가 교장이라면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젊은 교사를 쓰지 않을까요?

장서현(이대교육 2) : 네 고용창출로 이어지기에는 분명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이 알차고 가치 있는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지선(이대교육 2) : 이게 배움이라는 것이 어느 세대에게나 중요한 것이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꾸준한 학습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면 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기가 인생의 쇠퇴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발전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있는 프로그램들이 내실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사도 하고 발전방향을 국가적으로 고민해봐야 합니다.

송현지(이대교육 2) : 네, 여러분들께서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복지의 형태로서 의료복지, 평생교육 등을 말씀해주셨는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복지는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정부의 재정 여건과 복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약을 일부 수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복지의 최우선순위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질병, 장애 등의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복지가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국가의 노인비율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대학생인 제가 걱정 할 만큼 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한 복지체계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공약이, 특히나 노인복지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논의를 통해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체제를 갖추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번 연구모임을 진행해보았는데요,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 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④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좌측부터 서영채, 공현덕, 김영재 (삼육경영 2)

김영재(삼육경영 2) :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대선 시 내걸었던 복지 공약을 불가피하게 수정하게 되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포함한 국민들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한 것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복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복지에 필요한 자금 마련 등 평소 생각해왔던 것들을 자유롭게 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급격한 성장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성장정책을 펼쳐 성장한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간 다시 상처가 곪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금형 복지보다는 서비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취업을 지원해 주고 후에 돈을 지급해 주고, 또 여성들의 출산 장려와 재취업을 위해 국가, 기업적으로 보육서비스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영채(삼육경영 2) : 저는 복지에 대해선 우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무상고교교육에 대해 현재 교육계에선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들이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보다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기 수월한 환경 조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금복지와 서비스복지 중에선 저도 고용창출형의 서비스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닌 일자리제공과 기회제공의 자립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진(삼육경영 2) : 저도 서비스형 복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현금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현덕(삼육경영 2) :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복지가 되어야지 보편적 복지가 된다면 혜택을 나눠주어야 할 상위계층의 자녀들도 복지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세금의 분배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진(삼육경영 2) : 근데 그렇게 차별적으로 시행된다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못 사는 아이들로 인식되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교육상에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참 애매하고 힘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자체 중 예산독립도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텐데도 말이죠.

공현덕(삼육경영 2)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공약으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가 제대로 성공한다면 몇 백 조에 달하는 세수를 걷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작은 공약부터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복지정책엔 뭐가 있을까요?

김영재(삼육경영 2) : 저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약간 있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업을 실패했을 때의 타격과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쉽사리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성장을 위해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과 개인창업도 중요한데, 만약 사업 실패 후 받게 될 타격을 덜 받을 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준다면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박제진(삼육경영 2) : 그 방법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생겨나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나라에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극소수의 엘리트들만 지원을 받게 돼서 결과적으론 무의미해질 것 같습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번엔 여성복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출산 여성 재취업인 일명 리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출산 여성을 우대해서 먼저 채용하는 식의 프로그램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현덕(삼육경영 2) :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되었는데 그런 정책들이 활성화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 후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많은 요즘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정들이 많아질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으로 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 좋은 흐름으로 알고 있기에 출산 장려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여성분들에게 대한 복지, 예를 들어 출산 후의 휴가라든지 복귀 후의 자리를 잡는 부분 등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채(삼육경영 2) : 그런데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같은 여자 상사라서 거리낌 없이 출산 후 휴가를 신청했는데도 거절당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기업 내 분위기 등이 아직 출산 후 휴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제진(삼육경영 2) : 제도가 있어도 분위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고쳐져야 되겠네요. 출산 후 휴가에 대해선 남편에게도 공동으로 양육의 책임을 지게 해서 여성 과 남성 모두 출산 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여성들의 휴가 신청 시 부담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처음에 얘기가 나온 리턴십 프로그램도 좋지만 애초에 여성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방금 말했던 출산 후 휴가 등의 제도가 더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현덕(삼육경영 2) : 최근 한 여군이 임신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임신 중 혹은 육아 중인 여성들에 대한 정책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출산은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이죠. 혹시 다른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정책이 있나요?

서영채(삼육경영 2) : 저는 청소년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비행청소년들의 각종 범행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의 맞춤교육과 상담을 해주는 보호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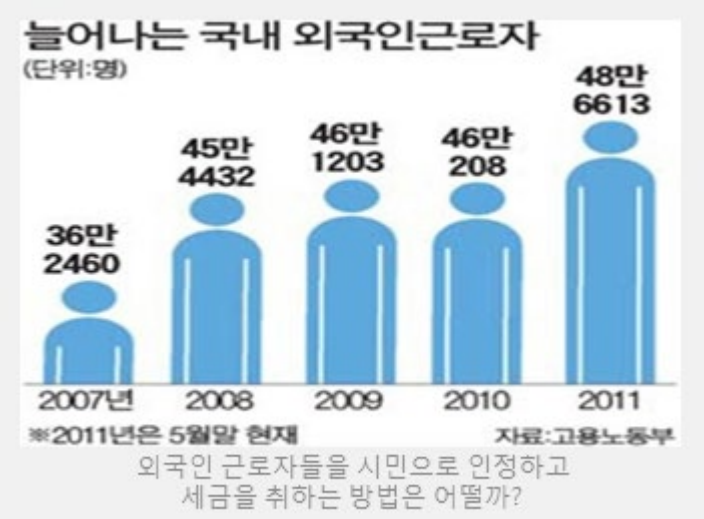
김영재(삼육경영 2) : 네, 요즘 청소년 일탈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고 미성년자 성매매 등 위험한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니 그런 청소년들을 보호해 줄 체계적인 사회적 울타리가 필요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증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복지는 세금과 비례합니다. 복지가 잘된 국가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우리나라는 가 부실한 만큼 세금은 그만큼 덜 내죠. 많은 국민들도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막상 증세를 한다면 반발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증세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공현덕(삼육경영 2) : 우리나라가 빈부격차 차이가 큰데 빈부격차에 따라 차별적으로 증세를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제진(삼육경영 2) :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은 부자들이 탈세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크게 터졌던 페이퍼컴퍼니처럼 돈이 많을수록 더 탈세를 할 방법이 많아지니까요.

서영채(삼육경영 2) : 탈세할 가능성이 높다곤 해도 가진 자들이 조금 더 내놓아야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탈세를 한다면 그걸 좀 더 강하게 단속하는 방식을 찾아야겠죠.



박제진(삼육경영 2) :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받는 방법은 어떨까요?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도 세금을 받고 그에 따라 혜택을 준다면 좀 더 증세에 대한 고민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공현덕(삼육경영 2) : 좋은 방법 같긴 한데 외국인 숫자가 많은 만큼 사건사고도 많기에 쉬운 방법은 아닐 거 같습니다. 안산에만 가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은 걸 알 수 있듯이 아직 우리 사회는 외국인들을 받아 들일 만큼 개방적이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재(삼육경영 2) : 생각해보면 요즘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대부분 주방 아주머니들도 외국인들이시고 국제결혼도 증가하는 추세라서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인식적인 부분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복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도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준비에도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⑤ 인천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우갑 (인천 정외 3):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천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 칼럼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토론 주제는 증세입니다.

따라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쓴 저의 발제를 들으시고, 증세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증세가 필요하다면 어느 세목에서 증세를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세를 할 경우 조세에 대해 갖는 반감인 조세 저항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세 저항과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 또는 해결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 관련 뉴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초 노령 연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65 세 이상 노인 인구 전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기초노령연금을 65 세 이상 노인 인구 100%가 아니라 현행의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원 부담 때문인데요.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초노령연금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60 년에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18.6%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3%로 25.8%인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5 위의 국가가 된 정도라면 이제는 증세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세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를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발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재원을 위한 증세 필요할까요?

김호중 (인천 정외 2): 저는 먼저 복지에 있어서 어떤 복지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복지를 하겠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얼마나 잘 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상 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 등록금과 같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선별적 복지를 하면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그렇다면 지금 토론자께서는 복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고,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함에 있어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증세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호중 (인천 정외 2): 증세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잖아요. 하지만 담뱃값 인상처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적은 부분에서 증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재승 학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승 (인천 정외 2): 저 역시도 앞서 말한 학우와 마찬가지로 증세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가 점점 확대되고 그리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그렇다면 김영진 학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인천 경영 1): 지금 기본적인 증세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월급이 안 오른 지 꽤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세금만 무작정 올리면 다 죽으라는 소리고요. 꼭 필요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쪽에서 세금을 충당해야지 없는 주머니에서 털어서 증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그럼 김영진 학우께서는 보편적 증세는 반대하지만 선별적 증세는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고소득자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 것은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김영진 (인천 경영 1): 네 맞습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그렇다면 장지구 학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지구 (인천 산경 4): 대체적으로 세금을 걷는 측면에서나 세금을 쓰는 복지에서나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세금을 걷는 데에 있어서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고 어려운 사람들은 적게 내고 이런 것이 제대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 세제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점차 줄여나가서 기업들이 이제 세금 혜택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쟁력을 갖춰서 성장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멀쩡한 보도 블록을 교체하는 것이나 최근 인천시에서 30 억을 들여서 불꽃 축제를 진행한 것을 봤을 때 물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는 했지만 세금이 많이 부족한 인천시가 그런 곳에 세금을 쓰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적당한 세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증세는 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얼마나 잘 쓰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차등적인 증세를 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있고, 대기업의 세제 혜택을 감면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세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많은데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만연 학우.

이만연 (인천 정외 3):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복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계속 확장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 만큼 세수 확보가 필요하고 증세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주셨지만 고소득층에 세금 부과를 가중하자는 차등적인 방법으로 증세를 하자는 데에 있어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고소득층에만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돈 많으니까 무조건 너희가 더 내라 이렇게 하면 저항이 심할 것이고, 현실성도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법망 피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세율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더해서 그 부분만으로는 세수가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들의 증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율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소득별로 나누던가 하는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차별적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세금을 조금씩 더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이만연 학우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보편적 증세를 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금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도를 정해서 조세 저항도 줄이고, 현실성도 높이자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학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저는 증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복지 때문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현재 복지를 하는데 필요한 세수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증세를 할 필요 없이 경제 성장을 하면 세수가 더 걷히겠죠.

기업이 더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매출이 많이 오르고,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세만이 세수 확보의 유일한 대안인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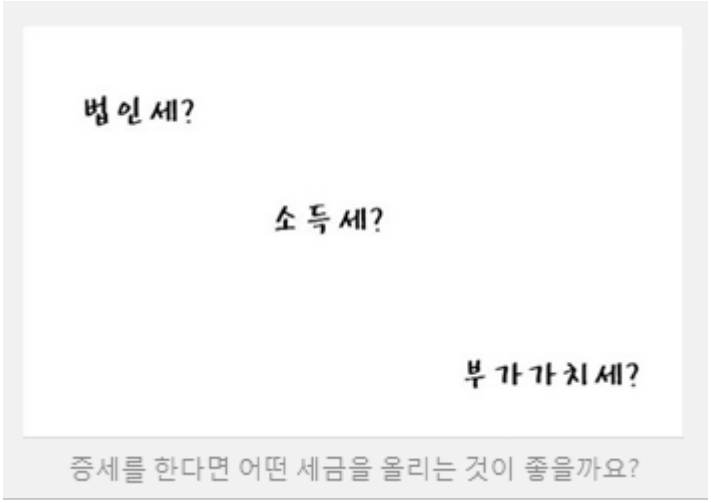
오히려 증세가 과도해지면 세금이 더 안 걷힐 수도 있거든요. 탈세가 일어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탈세가 많이 일어나는데 국세청이 그런 것만 잘 잡아도 상당 부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제도의 흠결만 바로 잡아도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논란이 많은 증세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가 제 생각입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그럼 조지훈 학우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어쨌든 증세라는 것도 세수 확보를 위해 하는 것인데. 꼭 세수 확보를 증세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통하는 것이 좋고, 증세의 경우 탈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세는 안 하는 것이 좋고, 국세청이 탈세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하자면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증세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 정책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복지 정책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예산도 늘어나야 하므로 증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증세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세를 하게 된다면 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세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부문을 증세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증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가정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선시 되는 증세 분야는 불로소득과 관련한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지 거래세, 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이런 것 위주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지 서민들의 소득세를 건들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조지훈 학우께서는 증세를 하게 될 경우 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부동산세나 증권 거래세 같은 불로소득세를 증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호중 학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중 (인천 정외 2): 저는 전반적인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뱃값 같은 것을 올려서 재원을 확보하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증세는 필요하지만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전기세 같은 것에서도 증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세가 낮기 때문에 한국 전력의 재정 상태가 안 좋잖아요.

하지만 한전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세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진 (인천 경영 1): 전기세가 싸다고 하셨는데 가정용 전기세가 있어요. 하지만 한전은 산업용 전기세의 적자를 가정용 전기세의 흑자로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그리고 김호중 학우는 국민들의 생활 형편을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세를 올려서 국민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승 (인천 정외 2): 저는 앞서 말한 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는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법인세 증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얻은 이익을 법인세의 형태로 다시 국가나 사회로 되돌려주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한다면 국가 운영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지금 유재승 학우께서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국가는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을 키워서 국가나 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증세의 경우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나 해외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요.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최근 들어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국가 전체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린다면 해외 기업의 투자는 더 감소하고, 국내 기업들도 외국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활발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법인세 증세가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자본 투자 유치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법인세는 대기업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법인세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중소기업에도 타격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져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들에 또 다른 부담을 주면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법인세 증세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지구 (인천 산경 4): 저도 추가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측면이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 전 정권에서 인하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봤다고 하죠. 신문 기사를 보면 10 조 이상 법인세가 덜 걷혔다고 하는데. 법인세가 증가하면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차등을 둘 수 있지 않냐. 중소기업 같이 어려운 곳에 복지를 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 위주나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들을 위주로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제도적인 보완을 통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연장 선상에서 말하자면 현재 법인세도 차등적인 구간을 나누고 있죠. 하지만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하기가 좋다고 하셨는데 일부 대기업만 잘 나갈 뿐 여러 기업들이 환수지 이런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현 상태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대기업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더 부담이 되는 것이죠. 중소기업도 해외랑 경쟁을 해야 하는데 너무 세금이 많아지면 경쟁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말고 대안이 없는가? 법인세 말고도 다른 세수 확보 대안이 있는데도 굳이 법인세 증세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그렇다면 조지훈 (인천 정외 4) 학우는 법인세 증세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있죠?

조지훈 (인천 정외 4):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불로소득에 관해서 증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인세 증세는 이중 과세인 것이에요. 기업에서 일하는 사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고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또 법인에다가 세금을 메기는 것이에요. 따라서 법인세 증세는 정의의 원칙상에서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유재승 (인천 정외 2):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법인세를 올리면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는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지원 방안은 많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과 더불어 법인세를 올린다면 중소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지금 계속해서 법인세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세목을 증세시켜야 한다는 의견 없으십니까?

장지구 (인천 산경 4): 저는 사치품에 대해서 증세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가의 핸드백이나 고가의 자동차 등 이런 것들에 대해 세금을 더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고가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품에 대해서 세수를 확보한다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카지노나 경마공원 이런 데에서 세금을 올린다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과도하게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품이나 사행성 산업에 증세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첨언을 하자면 말씀하신 세수 증대 방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면세를 받는 집단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 집단이라든지 농민, 어민들이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들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도 대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이 다 못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농도 많은데 그런 부농들까지도 세금을 면제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농민들에 대해서도 증세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종교인들에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혼 남녀에게 세금을 매기는 싱글세를 도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자녀 가구들은 출산을 통해서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들은 다자녀 가구에 비해 국가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도 적게 냅니다. 따라서 싱글들에 대해서 싱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네, 면세 혜택을 줄이고, 우리나라 국가의 위기인 저출산, 고령화 해소를 위해 싱글세 도입도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는 조지훈 (인천 정외 4) 학우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출산 장려나 고령화 사회 대비 목적으로 결혼 적령기의 미혼 남녀에게 세금을 메기는 것이 싱글세 인데요.

싱글세 같은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이 많고 사회적 논의도 더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바로 도입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장지구 (인천 산경 4): 저도 조지훈 학우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농민이나 어민에게 면세 혜택을 줄이는 부분은 그 영향을 확실하게 평가를 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증세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증세에 대해 부정적이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이나 증세로 인한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제 생각에 조세 저항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 더 돈내기 싫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돈을 냈는데 거기에 따른 혜택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논리라고 봐요. 한마디로 비용 대비 편익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이런 조세 저항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세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걷어봤자 나한테 득이 될 것이 뭐냐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은 고착화 되어 있고, 당장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국가가 걷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중 (인천 정외 2): 저는 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법인세 증세에 대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지구 (인천 산경 4):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리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승 (인천 정외 2): 김호중 학우의 말은 기업들에 혜택을 줌으로써 법인세 같이 간접적인 사회 환원이 아니라 초과 이익 같은 것을 사회에 직접 환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 것 같습니다.

김호중 (인천 정외 2): 제가 용어를 잘못 써서 의견이 다소 잘못 전달되었는데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장지구 (인천 산경 4): 하지만 저는 그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에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기업은 이익 추구 집단이지 사회 기여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일부 계층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업들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인세를 올려서 국가가 그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국민의 조세 저항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겠느냐에 대해 말해보자면 세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라는 인식이 조세 저항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원인을 생각해보자면 세금 중에 낭비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일 거에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서 제대로 썼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내가 피, 땀 흘려서 낸 돈이 잘 쓰이고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책임이 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야 하는데요. 비록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이 아니라 빈곤층처럼 사회적 약자에 쓰인다고 하더라도 “왜 세금을 냈는데도 나한테 혜택이 안 돌아오지?”와 “아 내 세금이 빈곤층에 쓰였구나”는 다른 것 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방법을 통해 조세 저항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장지구 학우께서는 세출에 있어서 투명한 구조를 만들고,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세출 항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저도 장지구 학우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방법은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증세의 정당성을 잘 설파하는 것인데 이것은 총론이고, 각론으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가진 자들을 건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논리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거든요. 나의 처지보다 나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마련인데요. 만약 나보다 처지가 나은 사람이 나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나도 세금을 내기는 싫지만 나보다 처지가 나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내니까 참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조지훈 학우께서는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을 2 가지로 말씀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정치인들이 증세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고소득층들이 일반 계층보다 세금을 많이 내기는 하지만 일반 계층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세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파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승 (인천 정외 2): 대학생의 시각에서 본다면 증세의 당위성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증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만 알 뿐 왜 증세가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따라서 대학생부터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과 증세의 필요성을 알 필요가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이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인천 정외 4): 어려서부터 세금이 국가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금을 왜 더 내야 할까에 대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해 시정 활동을 하고 있는 고양시

이만연 (인천 정외 3): 최근에 고양시가 고양이 캐릭터를 접목한 SNS 활용을 통해 시정 활동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해서 현재에도 있지만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각 부처의 SNS 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갑 (인천 정외 3): 이만연 학우가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고양시말고도 경찰청 같은 곳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SNS 를 통해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정부 부처들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서 정부 기관이 폐쇄적인 곳이 아니라 개방적인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증세에 관련해서도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세는 필요한 것인가', '증세를 한다면 어떤 세목을 올릴 것인가', 증세로 인한 조세 저항이나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보았습니다. 증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2 차 인천대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⑥ 상명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재혁(상명국통3), 허유민(한양컴공2), 김필수(광운법학3), 한승규(상명일교3)

김재혁(상명국통 3) : 안녕하세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모임 주제는 증세 없는 복지의 과제, 복지의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큰 주제로 하여, 현재 뜨거운 감자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복지국가를 향한 발걸음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양성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복지국가는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데요. 복지국가를 달성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의 유연성이 생겨 고용촉진과 수요창출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의 성장촉진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복지국가를 향한 발걸음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란 것은 바로 복지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느냐일 텐데요. 지난 MB 정권 시절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 세율을 많이 내렸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기조를 계속 이어받고 있는 상태에서 증세 없는 복지 확충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증세 없는 복지 확충의 재원 마련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방안책을 제시했지만 이는 이번 정부가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복지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기엔 부족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소국가 경제자본영토인 우리나라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현재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이 이러한 시점에서 복지문제, 그리고 복지재원마련과 관련하여 저는 크게 3 가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로, 증세 없는 복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선적인 부자증세에 대한 찬반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부자증세만이 아닌 부자들의 우선적 증세를 통해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보편적 증세를 이끌어 낸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지공약의 원안 이행이냐 아니면 공약축소냐에 대한 생각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승규(상명일교 3) : 우선적인 부자증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재혁 학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권 때 부자들의 감세정책은 그들의 배만 더욱 배불리 해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촉진과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 고용창출에 힘써달라고 시행한 MB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부의 소득 집중만 더욱 심화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증세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우선적인 부자증세는 꼭 필요한 사항이며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필수(광운법학 3) : 저도 한승규 학우의 생각과 같습니다. 우선적인 부자증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OECD 국가별 비교에서 우리나라 부자들이 다른 나라의 부자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적게 내고 있다는 사실은 부자증세에 대한 찬성의견에 힘을 실어 줄만 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만 증세를 부과한다는 것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저는 최종적으로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선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선 보편적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받기만 받는다면 이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보편적 증세를 하되,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간의 증세 수준을 차등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OECD평균보다 못미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

허유민(한양컴공 2) : 저 역시도 우선적인 부자증세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현재 세금을 과연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 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그 외 국세를 낭비하는 여러 사업들이 아직도 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투명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세출구조를 먼저 조정한 이후에 부자증세를 논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조세지출반감이 큰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부자 증세든

보편적 증세든, 증세에 대한 논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걷어들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재혁(상명국통 3) : 네, 학우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부자증세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셨지만, 그 외 선별과제나 문제점 등도 짚어주셨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편적 증세에 대해선 동의하시는 입장인가요?

김필수 학우분께서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셨고, 나머지 두 학우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한승규(상명일교 3) : 저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가진 자들에 비해서 살기 힘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 복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진 자들, 즉 부자들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회에서 최고의 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복지라는 것이 가진 자들의 솔선수범한 희생을 통해 어려운 이들이 좀더 원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허유민(한양컴공 2) : 저는 한승규 학우와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저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라면 보편적 증세는 더더욱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증세? 선별적 증세? 그것이 문제로다

김재혁(상명국통 3)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증세에 대해서도 학우 여러분들간의 상반된 의견이 존 재하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더 정치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복지공약 원안이행, 축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필수(광운법학 3) : 저는 대선 때 나온 복지공약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었죠. 복지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파격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즉, 실질적인 복지를 위하기보단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지재원마련도 시원찮은 마당에 자꾸 원안 이행을 논할 것이 아니라 복지공약을 축소하는 것도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한승규(상명일교 3)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자증세를 먼저하고 확보되는 복지재원으로 복지공약을 최대한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복지공약을 축소하게 되면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게 축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복지국가로의 길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보편적 증세를 통해 복지공약 원안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에 반대합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복지공약 축소를 하는 것이 현 경제적 상황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허유민(한양컴공 2) :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 한승규 학우님과의 의견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저는 부자증세만 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증세를 하고 복지는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한승규 학우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들에 대한 선별적 증세는 부자들의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그들이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고 많은 노력과 땀방울을 흘리기 때문이죠. 그것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김필수(광운법학 3) : 저 역시도 증세는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 부자들은 다른 나라 부자들보다 내는 세금이 현저히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로 봤을 때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죠.

국민 전체적으로 내는 세금의 양이 적다는 것을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세를 한다면 보편적 증세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 시작은 부자들부터 시작한다는 것에는 현 상황에서 찬성하는 바이구요.

한승규(상명일교 3) : 저는 허유민 학우분과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저는 증세의 경우도 선별적으로 해야 하고 복지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증세를 해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그만큼의 복지를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에 책무를 다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복지국가로 향하는데 사용되는 가진 자들의 증세는 그들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진 자이며 기득권 아닐까요?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재원마련,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김재혁(상명국통 3) : 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문제, 역시 첨예한 논쟁이 오늘 토론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우분들의 생각,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선 대한민국,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 선택과 방향설정으로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⑦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김재희(과기영어 3), 안채윤(과기행정 3), 이정빈(과기행정 3), 류덕환(과기행정 2), 장순호(과기안광 4), 김근우(과기촉공) 입니다.

김재희(과기영어 3): 다시 이렇게 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새롭게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들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 차 연구모임, 복지의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례토론회를 바탕으로 제가 선택한 주제는 청년들이 느끼는 노인복지입니다. 저는 제 오빠가 한 말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오빠가 '이제 연차가 쌓여서 월급이 올랐는데 그것보다 연금이 더 올라서 월급이 오히려 깎였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이도 없어서 내가 이 연금을 부어도 다시 돌려받지도 못할 거 같은데 이 연금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연금 안 받고 차라리 지금부터 적금을 드는 게 더 낫겠다.' 라며 연금제도에 회의감과 더불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수정하며 노인복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노인복지는 부담이신가요? 혹은 다른 청년들에게 노인복지가 부담일까요?

안채윤(과기행정 3): 저는 이 주제를 듣고 저번에 들었던 강연이 생각났습니다. 그 강연을 진행하시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의 청년들이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그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노인복지가 확대되면 이 재원이 많이 줄 것이지만, 이는 앞으로도 거둬질 연금으로 메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청년들이 우려하는 결과가 그렇게 빠르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노인복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듭니다. 노인복지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시스템은 개선되어 할 거 같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도리와 같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노인복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류덕환(과기행정 2): 저도 안채윤 학생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이 고갈됨을 우려하는데 이것이 사실 11%~15%정도만 증세를 하면 그 고갈되고 있는 기금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초연금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청년들의 소득은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다른 부유한 계층에 비해 그렇게 많이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청년층에게 그다지 부담일 거 같지는 않습니다.

장순호(과기안광 4): 현재 노인복지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거두어지는 세금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청년들의 노인복지 부담에 대한 저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지금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걷히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에 맞게 또 눈에 보이게 노인복지비가 걷히고 사용된다면 젊은 세대에 반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빈(과기행정 3):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년 혹은 노년세대가 이를 부담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이전 세대는 짊어지지 않았던 짐인데 그에 대해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약에 복지를 선심성으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낭비시키지 말고 오히려 긴축을 해서 부양할 수 있는 비율을 예전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면서 이를 부담으로 느끼지 말라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김근우(과기환공): 이를 부담으로 느끼냐 안 느끼냐는 결국 인식의 문제고 도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몇몇 윤리적인 개념도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물론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의 도리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맞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더 부담을 느낍니다. 어느 수준까지 청년들이 감수하고 이해해야 하는 도리인지 한계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언제까지 이 노인복지를 내가 부담해야 하나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왜 청년들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되었나 생각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문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더군요. 해방 후에 이전 세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을 이렇게까지 급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민적으로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챙기는 것은 극소수의 기득권 층이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경우에는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죠.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지나온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청년들에게 너의 것을 챙기면서 배려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런 인식의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요새 발전사가 부채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의 연봉은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 내려갔던 연봉을 다시 올렸던 것뿐입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본인의 보수를 보고 불만을 품었던 사원들에 의해 이렇게 된 것이죠. 이들도 그냥 다른 신입사원들에 비하면 엄청난 보순데 선배들로 인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렇듯 기존 세대와는 다른 본인들을 보며 청년들이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청년들을 이기적으로 치부하며 무조건 이것이 도리니까 노인복지에 기여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노인복지가 부담이고, 아니라고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채윤(과기행정 3): 저는 여러 조사결과가 노인복지를 바라보는 청년들에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몇 명이 노인인구 한 명을 부양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가 청년들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김재희(과기영어 3): 일부는 노인복지가 부담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일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노인복지를 도리나 윤리적인 문제로 합리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청년들의 노인복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우(과기환공):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날의 65 세 이상이신 분들이 그렇게 건강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정하게 산책도 다니시고 활동도 가능하신데 이런 분들께 연금을 드려야 할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것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의 경우도 정년퇴직 후에 그 연금에 기대어 생활하시고자 하십니다. 이처럼 연금을 일정나이 이상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은 노동의지만 떨어트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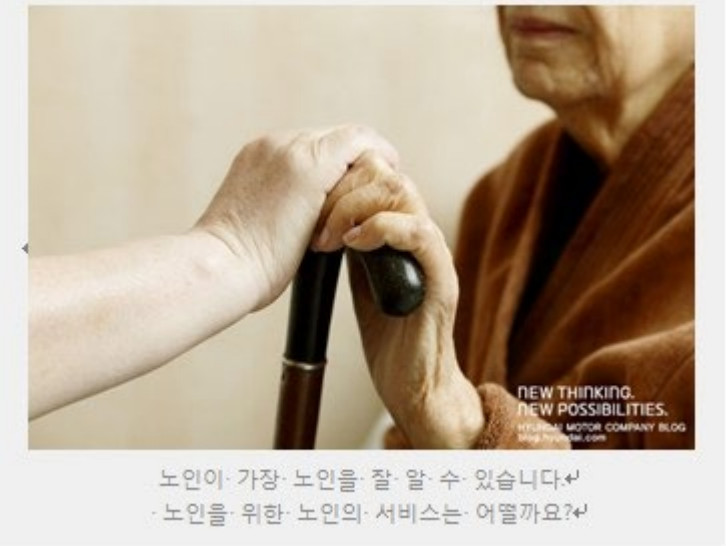
따라서, 노인복지 특히나 연금을 줄 때는 정확한 선별적 복지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노인복지가 앞으로의 노년세대의 노동의지를 떨어트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작동해야 합니다.

류덕환(과기행정 2): 저는 그를 위해 더 많은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사에 노년층이 많으면 회사분위기가 쳐져 회사측에서 반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미비하여 노년층의 재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죠.

김근우(과기환공): 하지만 재고용의 경우는 회사측에서도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이용해서 임금을 적게 받아도 노년층이 계속해서 일을 한다면 그들은 수입이 있어서 좋고, 사측은 그들이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덕환(과기행정 2): 그러나 그 또한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직과 같은 경우는 그런 숙련된 인력이 좋지만, 서비스 업종은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죠. 따라서, 그는 업종에 따라 한계가 있는 정책입니다.

이정빈(과기행정 3): 더욱이 이는 청년실업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데 이처럼 노년층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것이죠.



노인이 가장 노인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노인의 서비스는 어떨까요?↵

안채윤(과기행정 3): 그래서 저는 재고용은 제도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사실 노년층에게 직업을 주기란 생산성 측면에서도 어렵고, 노년층 스스로도 그 일을 힘들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노인을 위한 노인 서비스'를 생각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이 비슷한 연령이라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서로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교류될 것 입니다.

장순호(과기안광 4): 저 역시 노년층에게 돈으로 복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층에게 돈만이 행복이라고 확답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복지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노인들에게 일을 주자는 생각을 지지합니다.

법인세를 강화한다거나 지하자원을 양성화 해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비스복지를 늘리는 것이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 정부 등 여러 입장에서 더 필요합니다.

안채윤(과기행정 3): 그리고 특히나 서비스 복지를 할 때는 노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그 복지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정빈(과기행정 3):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에게 준 건데 가족이 대신 사용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경제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노인의 존엄을 위해 국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위해 일해 오신 분들께서 퇴직을 하시면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회는 방지해야 하는데, 선별적 복지를 하면 과연 그것이 될까 의문입니다.

김재희(과기영어 3): 그럼 지금은 노인복지의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청년들의 입장에서 노인복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정빈(과기행정 3): 청년들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액조정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내가 내는 복지비용이 어떻게 쓰일 지보다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액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장순호(과기안광 4): 제가 인턴 생활을 했을 때, 기부를 통해 세금혜택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비를 하는 것보다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국민연금을 내면 세율을 줄여준다거나 다른 세제 혜택을 주면 연금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희(과기영어 3): 노인복지 시스템의 여러 개선방안에 관한 아이디어, 세액 관리 관련 아이디어 등 여러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논제들은 다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외에 더 청년문제와 복지와 관련되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김근우(과기환공): 오늘날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같은 보수를 받는다면 복지를 위한 세금을 늘리는 데에 저항이 조금은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금을 대기업에 더 분산시키고 이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청년들의 취업률도 늘고 세금에 대한 거부감도 더 줄어 결국에는 복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채윤(과기행정 3): 청년들을 타겟으로 한 복지 혜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나 창업 등 사실 청년들을 위한 복지도 많은데 노인복지만 부각되다 보니 청년들이 뺏기고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요새 유행하는 CSV 같은 개념을 복지에도 적용시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CSV 란 기존의 기업이 책임감으로 인해 사회에 기여했던 CSR 방식과는 달리 기업이 사회와 함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닌 주고 받는 개념인데요.

이처럼 복지도 한 세대가 또는 특정집단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지를 줌으로써 다시 그것이 다른 형식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빈(과기행정 3):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의 기득권층이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노인복지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노인 인구 한 명이 될 거라는 측정을 바꿀 수 있도록 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통한 기부문화 정착도 발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 같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희(과기영어 3):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년들이 노인복지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공유하였는데요. 더불어 청년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의 문제, 사회기득권층의 협조에 대한 이야기, 청년의 저항을 줄여줄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 홍보, 주고받는 복지 등에 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고령화와 복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기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를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연구모임을 마치며 다시 한 번 좋은 의견 나눠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⑧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김현아(숙명글로벌3), 방태연(숙명홍광3), 전슬기(숙명홍광3)

김혜인(숙명홍광 3) : 먼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토론문, 요약본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테지만 지난 9 월, 복지의 방향성에 관련한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정계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숱하게 회자되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지” 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대선에서도 복지 정책이 후보들 간 공약 경쟁의 핵심이었으며, 대중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 가는 추세인데요.

우리 사회에 복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복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지의 방식에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부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복지를 국가의 배려 또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구로 보는 입장입니다.

반면 보편적 복지 주창자들은 복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파악하여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의 우선 순위에 관련하여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숙명글로벌 3):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최초로 형성된 계기 자체가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능을 위해 사람들이 권력을 국가에 이양한 것이지요. 만일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면 보편적 복지에 비해 “모든 국민을 보호” 한다는 기능이 저하되리라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 가장 큰 논란 중 하나가 부자에게 복지를 해 주어야 하느냐는 명제입니다. 재벌 총수의 자녀가 무상 급식을 왜 받아야 하느냐, 세금의 낭비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러나 부자도 나라에서 보호해야 할 국민입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복지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게 되면 '과연 누구를 도와 줄 것인가' 라는 대상 선별 기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례로 소득 분위를 나누어 복지 대상자를 결정한다면, 겉으로는 합리적인 듯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김혜인(숙명홍광 3): 보편적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신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언하자면 부자들도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편적 복지라는 방식은 선별적 복지로 인한 대상자 선정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사회적 완충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방태연(숙명홍광 3): 저도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복지관에서 6 개월 간 행정 업무를 도운 적이 있는데요. 복지관 방문자분들 중에서는 아주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먼 친지 중 자산가가 있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대상에도, 차상위계층에도 포함되지 못해서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어야 이렇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또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면 낙인 효과가 나타나거나 복지 대상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야 합니다.

전슬기(숙명홍광 3): 저는 선별적 복지를 지지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전반적인 소비량도 늘어납니다. 소비가 없으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지요.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분배뿐 아니라 성장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면 개인당 수혜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액은 줄어들 것이고요.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단 선별적 복지를 하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할 듯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도 가난한 학생은 못 받았는데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경우가 종종 눈에 띄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선별적 복지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혜인(숙명홍광 3): 두 분께서 각각 보편적 복지에는 구멍-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점과, 선별적 복지는 효율적이라는 점을 언급해 주신 듯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점차적으로 복지 범위를 확대해 가면 모를까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 상황에는 효율적이고 분배 기능이 높은 선별적 복지가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한국의 빠른 산업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나 불평등의 심화 때문입니다.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 분배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복지의 근본적 목표는 분배 아닌가요?

선별적 복지는 복지가 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때문에 분배 기능이 더 높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의 본래 목표에 보다 더 부합할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방태연 학우께서는 수혜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보편적 복지가 오히려 빈민층을 제대로 돕는 길일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당연히, 훨씬 양극화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양극화 현상의 해소에는 선별적 복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빈민층을 돕기 위해서라면 대상자 선정 기준의 허점을 재정비할 생각을 해야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생각을 하는 것은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복지의 방식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괄적으로 들어 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학우께서는 부자도 국민이므로 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부자의 복지 수혜에 대한 논의는 복지의 방식에 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화두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과연 재벌 총수의 아들은 무상 급식이나, 혹은 다른 보편적 복지를 받아야 할까요?

김현아(숙명글로벌 3): 저는 할 것은 하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부자라 해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입니다. 대신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북유럽 등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을 보면 부자에 대한 과세율이 우리 나라보다 높지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선 선별적 복지를 채택하고 점차적으로 선별적 복지로 이행하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논의를 끌고 가다 보면 보편적 복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발이 있더라도 초기에 시행을 강행한 후, 문제점을 바로잡아나가야 합니다.

방태연(숙명홍광 3):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벌 총수의 자녀가 무상 급식을 받는다면 배가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많이 번다고 해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다면,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도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지를 위한 세금은 모두가 냈으므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여 모두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여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전슬기(숙명홍광 3): 저는 약간 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논의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총수나 대기업의 필두들이 부정부패나 비리를 지양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탈세•탈루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거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등으로 인해 자산가들의 의식 수준 자체가 높은 듯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의무를 다한 후 보편적 복지 수혜라는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혜인(숙명홍광 3): 자산가의 복지 수혜에 대하여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된다,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내 주신 듯 합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세금 납부에 대한 의식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탈세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산가의 보편적 복지 수혜 여부와 더불어 최근 가장 이슈인 복지 관련 논쟁은 단연 반값 등록금 제도인데요. 대학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견지하고 계신가요?

전슬기(숙명홍광 3):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대학생인 저야 좋지만, 반값 등록금 제도를 시행하면 대학을 가는 것이 보다 쉬워지므로 대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우리 사회의 "대학 졸업장은 필수" 라는 분위기도 고착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일자리 경쟁도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요?

프랑스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우리 나라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대학 교육이 필요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진학하는 것입니다. 시간•비용상의 낭비-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대학 진학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 및 대학 진학 비용-도 없을뿐더러 일자리 경쟁도 적습니다.

김현아(숙명글로벌 3):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한국과 프랑스는 사회 분위기가 다릅니다. 프랑스나 독일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며, 국민들의 의식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대학에 가지 않으면 차별을 겪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힘듭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을 낮추어야 하므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등록금은 매우 비싼 편입니다. 프랑스는 1 학기 기준 30 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대학에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등록금 지원을 선별적으로 시행하면 앞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교육은 기본권이지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한국처럼 대학 진학이 필수화되어 버린 사회에서는요.

김혜인(숙명홍광 3): 김현아 학우께서는 교육은 기본권이지 프리미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에는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은 의무 교육 과정이라기보다는 선택적 고등 교육에 가깝습니다. 모든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선택적 교육을 받는 대학생들만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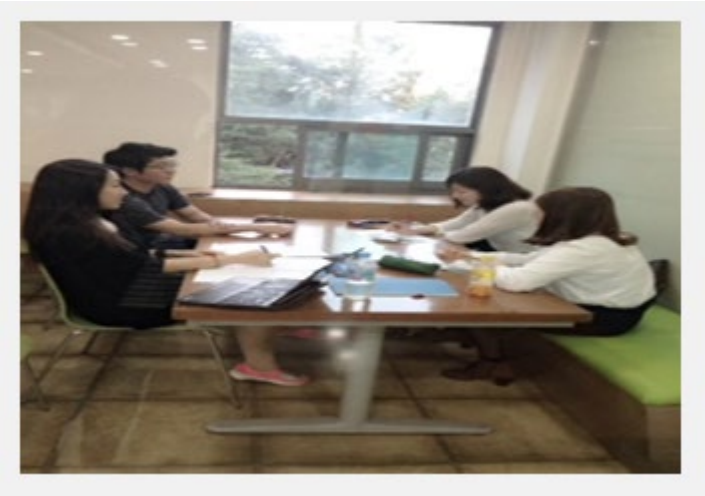
또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입니다. 오히려 복지 혜택이 더 필요한 것은 대학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과 그 가정이 아닐까요?

방태연(숙명홍광 3): 저는 선별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김현아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선별해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도 허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보편적 복지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김혜인(숙명홍광 3): 반값등록금 논제를 한국의 사회 분위기 및 대상자 선별 과정과 연관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학우들 간의 의견차가 있는 듯 한데요. 이 주제를 비롯, 오늘 논의한 복지의 우선 순위 관련 명제들은 논란이 있는 만큼 그 향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및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의견 교환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내 주신 숙명여대 학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⑨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백주아: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 수정과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노인연금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의 충돌도 심각하고 세간의 반응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정부의 최대과제는 복지 정책의 이행입니다.

정부가 내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위한 예산 조달, 확충 방법도 마련되어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인 것 같습니다. '복지'라는 키워드는 20 세기 들어서 최고의 관심 화두입니다. 먼저 각자 개인적으로 복지라고 했을 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은비: 아니오. 사실 우리 나이가 복지를 실감할 수 있는 나이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이다 보니 세금도 내지 않고 기껏해야 아르바이트, 인턴을 하면서 직장에서 조금 누리고 있는 복지 혜택 정도? 그래서 아무리 복지에 대해 말이 많다고 한들 다른 문제들에 비해 덜 관심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현식: 저도 사실 개인의 복지에 대해서 피부로 체감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점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현재 우리들의 부담은 훨씬 더 가중될 것이고 정작 우리가 복지혜택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는 복지 재원이 부족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문제 등을 접하면서 남 이야기가 아니니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백주아: 생각보다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네요. 일단 본격적으로 연구모임을 시작하기 앞서 묻고 싶습니다. 각자가 내리는 복지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강은비: 복지, 복지란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을 때 그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 것에 대한 대우,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성희영: 저는 복지사회를 풍요로운 사회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는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각자 나라가 처한 상황과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수준에 맞는 적정선이 지켜지는, 계층에 상관없이 각자가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복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인현식: 제게 복지란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며 모두가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일단 남들 잘 사는 것에 앞서서 나의 삶에 대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백주아: 복지에 대한 각자의 정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복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면 단순하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다음 식사 때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내년엔 어디서 지내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신의 지위와 수준에 맞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복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크를 먹든 햄버거를 먹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모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가 정의 내린 복지에 대한 자신들의 주관적 생각의 연속선상에서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지난 주 신문 기사에서 접했지만 당장 내년의 예산도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현식: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할 수 있으려면 일단 경제가 안정화된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세계 경제가 모두 어렵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경제 또한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와 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적자재정을 끌어와서 복지를 구현해나간다는 것도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 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사실 증세 없는 복지. 말은 좋죠. 세금은 더 걷지 않아. 하지만 복지 혜택은 늘어난다? 그런데 이게 그저 허울뿐이라는 겁니다.

강은비: 작년 대선 공약을 내걸었을 당시에 반대가 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재정을 끌어오는 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만 봐도 언젠가는 누군가 복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는데 증세를 조금이라도 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영: 저 또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새누리당 대변인이 복지 공약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고 외치면 무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습니다. 시민 설문조사 60% 이상이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성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주아: 다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계시군요. 희영양 말대로 공약을 내걸기에 앞서 정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식군 말대로 경제가 안정화되어야 수입이 창출되고 일자리도 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마련된다면 참 좋겠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증세라는 부분이 말이 쉽지 증세에 대한 조세 저항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조세의 정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그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떠한 설명도 없이 증세를 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원 마련에 있어서 일단은 조세의 정의를 확보하고 지하 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정책들을 펴면서 단계적으로 증세를 논의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생각만큼 실효성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당장의 증세는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증세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떤 우선순위를 따라야 할까요?

인현식: 차등이 평등이 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핀란드에서 MS 노키아 사장의 속도위반에 대한 벌금을 1 억 원을 매겼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이죠. 생각해보십시오. 한 달에 1 억을 버는 사람에게 5 만 원과 한 달에 88 만 원 버는 사람에게 5 만 원. 무엇이 평등한 것입니까?

이 세상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을수록 혜택이 많다고 하면 어불성설일지도 모르나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 모순이죠.

부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바쁘고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덜 내고 이러한 좋지 못한 상황이 끊임없이 순환하다 보니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차등이 평등이 될 수 있는 복지. 부유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희영: 증세에 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족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쨌든 증세가 필요하고 증세에 있어서도 고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걷는 방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여 그들이 소고기 먹다가 돼지고기 먹는 것 아닙니다.

또 중산층 중에서 과소비, 모방소비가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세금을 조금 더 걷는다면 불필요한 지출들을 줄일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위화감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현재 시행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의 정책 등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현재 실효성이 그다지 없다고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든 돈을 숨깁니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백주아: 부유세에 관해 요새 말이 많죠. 하지만 부유세를 시행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따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 부유세를 도입하자 억만장자들이 자본을 국외로 유출했고 그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국민배우 제라드 드빠리디유도 프랑스의 부유세 정책에 반발해서 국적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자들의 투자 의욕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서 오히려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을 위험도 있고요. 부유세를 흔히들 버핏세라고 말하는데요 워렌 버핏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부유세율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자들이 소득에 걸맞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죠.

강은비: 부유세. 사실 부유세를 적용하면 서민들의 호응이 클 것 같긴 합니다만 한 편으로는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라는 논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역차별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축적한 나의 부를 나누기 싫어서 탈세를 하는 마당에 부유세를 적용하면 탈세 같은 부정의가 훨씬 더 심하게 판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무조건적인 증세도 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현식: 소득세나 재산세와 같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유세에 관해서 그리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따르는 문제들이 쉽지 만은 않네요. 야측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론 법인세 인상 또한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하는 문제를 야기해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백주아: 증세도 쉽지 만은 않네요. 워렌 버핏처럼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사람이 솔선하여 함께 돕자, 서로 돕자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부자증세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텐데요. 조세피난처, 탈세와 같은 조세 부정의가 판치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근본적으로 시민의식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은비양의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돌아가봅시다. 마구잡이 식의 증세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복지, 질 높은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 수준과 질이 높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강은비: 사실 저희는 현재 우리가 복지가 어떠한가에 대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지적해줬듯이 시민의식의 부재로 인한 탈세와 부정의가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질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지를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만 요구하고 복지 수요만 높은데 쓸 데 없는 부분으로 돈이 새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성희영: 사실. 복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도 노인 연금 같은 부분에서 노인 분들께 푼돈 20 만 원 고작 드려서 사실 복지의 질이 높아 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얼마 더 얹어 준다고 해서 복지의 질이 높아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주아: 희영양이 방금 현금복지에 대한 한계점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복지 명목으로 현금 지급이 늘면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복지의 질의 문제를 논의 하면서 드는 생각은 현재 우리나라가 높은 교육 수준에도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고용률과 취업시장의 남녀 불평등 문제가 만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금 복지 부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적인 자기계발, 성취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희영양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바로 이 서비스 복지에 관한 것이에요.

인현식: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받는 복지가 눈으로만 보여지는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서 높은 혜택을 누리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영: 복지가 잘 구현되는 외국 사례들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복지를 확충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시너지가 창출될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 사례를 아예 모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 어서 확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주아: 오늘 토론의 핵심들을 잘 짚어주고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식 복지 모델의 구현 이게 최우선의 과제이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한 마디씩 느낀 점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영: 제가 생각하는 건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요. 복지가 잘 되려면 어찌되었든 한 세대의 희생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누고도 자기가 희생하고 싶지 않아하죠. 서로가 이기심을 버리고 다같이 함께 지속적으로 으쌰으쌰 잘 살아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은비: 시민의 의식을 키우는 것도 복지가 담당하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보다는 사람들의 의식을 깨울 수 있는 복지가 구현되길 바랍니다.

인현식: 오늘 토론하면서 느낀 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역시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사회로 가려면 어찌되었든 현실사회가 잘 정돈이 되어야 할 텐데요 한 세대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희생이라는 단어를 협동이나 헌신으로 바꾸어 생각해서 함께 열심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주아: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승주(경영 4):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준비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전해드립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성장에 사회적 관심이 쏠린 것에 비해 박근혜 새 정부에서는 복지로 여론의 포커스가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복지가 고용과 성장의 촉진제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학생 구직자들과, 이미 고용된 취직자들에게 어떤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할지 여러분들과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대학생 구직자들에게는 어떤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고용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최윤진(경영 2): 요즘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돈이 많이 들지만, 취업하기까지 드는 비용 또한 만만찮은 거 같아요. 4~5 만원씩 지불하며 매달 토익시험을 치뤄야 하고, 비싼 학비에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면 집이 웬만큼 잘 살지 않는 이상 아르바이트도 필수인 것 같구요. 그래서 취업 전까지 드는 이러한 비용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승모(신방 4) :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화가 나는 것이 토익이 공인 시험이라 어디든 많이 쓰이는데 왜 공인 시험을 ETS 라는 사설업체에서 담당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치는 데 4~5 만원 이상

드는 토익을 대체 할만한 공인 영어능력 시험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여 싼 값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학생 구직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복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 11시 방향 전형진(경영2)부터 시계방향으로 전희은(경영2), 이경필(경영2), 정재은(경영2), 강승모(신방4), 이동건(경영3), 김재민(경영2) ,최윤진(경영2) , 촬영자 본인 포함 총 9명 아울러 빨간색 비닐 파일 배부 완료

이경필(경영 2): 이명박 정부 때 인턴들이 정규직으로 대거 채용 된 것처럼, 여러 가지 고용의 기회를 확대 시키는 복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재민(경영 2): 사실 여성들의 정규직 채용을 기업들이 꺼리는 이유들 중 하나가 육아 문제인데요 복지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주어 여성들의 업무 집중도를 방해할 요인이 없어진다면 그 전보다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형진(경영 2): 우리나라는 대학생 숫자가 많지만 그 인력들이 전부 고용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인문계열은 상경계열보다 취직이 잘 안 된다는 불평이 많은 편인데 이러한 인력들이 대학을 나와도 백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사회 여러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잉여 인력들의 흡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희은(경영 2): 앞에서 대학생들 취직을 위해 필수인 토익의 응시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낮추거나, 국가 차원에서 더 싼값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대체적인 영어공인시험을 개발하는 방법의 복지혜택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입시 사교육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취업관련 사교육 시장도 규제했으면 합니다.

이승주(경영 4): 어떤 점 때문에 취업관련 사교육 시장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전희은(경영 2): 입시 사교육 시장 때문에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가 빈부격차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부잣집 학생들은 비싼 과외를 받고 좋은 대학을 나올 확률이 높아져 빈익빈, 부익부의 순환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취업을 위한 사교육 시장도 커져버리면 돈 많은 집 아이들은 대기업 인적성 문제들, 면접, 공기업 논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 경쟁우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대기업에 입사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봐요.

이동건(경영 3): 저는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비 충당, 기타 생활비를 위해 힘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업이나 취업준비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개선이 되어야 대학생 구직자들의 고용 창출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소득 분위별 지급액 등을 더 확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돈 많은 집 아이들에게 불필요하게 장학금이 누출되는 일을 줄이는 방안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정재은(경영 2): 저는 학과에 따라서 취업에서 필요로 하는 공부와 다소 무관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봐요. 사회복지 학과 같은 경우 학생들은 어차피 대기업 사무직을 가고 싶어하는데 졸업을 위해 160 학점을 복지 관련 역사, 제도, 학자 이름을 달달 외워야 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낮춰서 조금 더 취업 준비에 올인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승주(경영 4): 우리나라의 복지가 고용과 성장의 촉진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대학생 구직자들에게 어떤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할지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들을 종합해보자면 대학생 구직자들의 고용 창출이 활성화 될 복지 혜택이 주어지려면 현재 대학생 구직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지 혜택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취업 준비를 하기까지의 학비, 스펙 쌓는 비용들의 부담이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복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고용된 취직한 계층들에게 어떤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우리사회의 경제적 생산성을 높여서 총체적 파이의 크기를 넓힐 수 있을까요?

최윤진(경영 2):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술이나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혁신이 생겨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취업한 선배들 회사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단순업무와 상사들 갈굼에 시달리면서 술로 스트레스 풀고 그런 식인인데 이러한 계층까지 포괄해야 하는 건가요?

이승주(경영 4): 네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 줄수록 좋으니 직무 범위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껏 의견을 말해주세요.

최윤진(경영 2): 방금 말했던 대로, 경제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는 혁신을 고안할 권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R&D 분야의 사업부 고용자들에게 업무 혁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많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거나, 기업 총수들에게 주문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요.

이동건(경영 3): 저는 비 정규직, 임시직 종사자들한테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고 그 사람들 처우 개선과 관련된 복지 혜택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뉴스 같은 데서 회사 내에 사건사고가 생기면 주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서 생긴 것이잖아요.

정재은(경영 2): 저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 인력들한테 복지 혜택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라도 회사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면 맡은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서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을 지 같은 비생산적인 생각만 매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승주(경영 4): 노조에 대한 복지혜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희은(경영 2): 비정규직에 대해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요, 노조들은 여기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할 거 같아요. 만약에 정부에서 기업 회장들한테 노조들의 요구를 이전보다 더 많이 들어주라고 압력을 넣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더 꺼릴 것이라서 승주 오빠가 말한 고용 창출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형진(경영 2): 저는 우리나라 기업 조직이 성과주의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게 생산성 저하의 문제라고 봐요. 취업하신 형들 얘기 들으면 군대 문화가 많이 잔존한다고 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대 별로 이 달의 모범 병사 선정 할 때 FM 대로 성과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짬어느 정도 된 애들 순서대로 번 갈아서 주잖아요. 이런 문화가 아직도 있는 기업이라면 정부가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승주(경영 4): 약간 이야기가 취업자들보다 기업 자체로 새는 것 같은데 현직에서 일하는 피고용자들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복지혜택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필(경영 3): 여성 직장인들 육아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는 복지혜택이 많아졌으면 해요. 그런데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유급 출산휴가 받다가 이직하는 일도 많다고 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무척 화났었는데 기업주 입장에서는 오죽할까요. 그래서 무작정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악용 사례도 참작하면서 실효성 높은 복지 혜택이 고안되어야 될 거 같아요.

강승모(신방 4): 우리나라 사람들이 3D 업종을 꺼리고 대부분이 정규 사무직을 선호하잖아요, 저는 이런 현상이 공무원 열풍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경제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여러 분야에서 인재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한 쪽으로만 쏠리는 게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3D 업종에 대한 복지 혜택이 강화되면 이 쪽으로 그 전보다는 더 지원자가 많아질 것 같아요.

김재민(경영 2): 저도 윤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취업한 사람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혜택을 주려면 업무 분야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만큼 정부의 세금부담도 늘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복지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으면 경제 성장의 아웃풋을 가장 근접하게 낼 수 있는 직무가 IT, 이공계 분야라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논의된 경제 파이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쪽 분야에서 혁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니까요.

이승주(경영 4): 구체적으로 이공계 분야 취업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높이려면 어떤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해주세요.

김재민(경영 2): 예전에 삼성 휴대폰에서 QWERTY 자판을 처음 개발한 기술자가 핸드폰 분야에서는 엄청난 혁신을 창출해 낸 것인데 성과급을 생각보다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해요. 게다가 이공계 인재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 상경계 인재들보다 대우를 잘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 내 IT, 기술 직무의 고용자들에게 세금 감면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같은 가시적인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승주(경영 4): 네 의견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고용과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직자들과 취업자들에게 어떤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할지에 대하여 취업자들 영역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다소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여성 취업자들과, IT 이공계 분야 인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는데, 가장 취약한 계층을 support 하고 나아가서 경제 성장을 유인하는 것이 복지의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집어 주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⑪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승효(경희경영3), 이희철(경희경영3), 박동민(경희경영3)

임성현(경희경영 3) : 지금부터 증세 없는 복지, 복지의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타이틀로 복지 정책을 구사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9 월 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 연금 공약의 실현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철회하게 됩니다. 이 일을 두고 국민들의 반응이 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복지를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승효(경희경영 3) :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금전적인 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국민들은 복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 복지란, 국민들 모두가 잘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나누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인프라를 잘 구성하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국방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면에서 복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국민들이 복지를 금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국민들이 젊을 때 세금을 내고 늙어서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을 복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일해온 공무원들과 군인들에게 연금이 돌아가는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민(경희경영 3) : 현재 복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관련 기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복지를 집행하는 기관들의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기준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저보다 더 잘 사는데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지를 여러 계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평균적으로 맞추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재 국민들의 소득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임성현(경희경영 3) : 종합해보면 세 분 모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복지를 금전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철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승효(경희경영 3) : 증세 없는 복지가 애초에 시행하기 힘든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제시한 계획들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계획들을 제대로 실현하는 모습은 분명 칭찬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증세 없이 이러한 계획만으로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 재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약을 빠르게 철회한 점은 좋지만 불과 1 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철회할 정도로 실현시키기 힘든 공약을 내세운 모습을 보면서 이 공약은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져 아쉽습니다.

박동민(경희경영 3) : 저 또한 증세 없는 복지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초 연금 복지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세금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적은데다 복지에 지출하는 비용 또한 최저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재정 확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 연금과 같이 지출이 큰 복지를 하게 되면 국가 재정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는 저도 기초 연금 공약 철회는 오히려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 너무 표심 잡기에 입각한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후진국 수준과 다름없고 국민들도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 정책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지나친 복지로 최빈국으로 전락한 나우루 공화국

임성현(경희경영 3) : 기초 연금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칼럼에도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보면 마치 남유럽의 복지 정책이 생각납니다.

그리스의 경우 1900 년대까지 경제 대국 중 하나였지만 1980 년대 이후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유럽의 복지 실패 사례를 보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최승효(경희경영 3) : 예전에 서프라이즈에서 본 사례가 생각납니다. 호주 근처에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아주 작은 섬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가 아주 값비싼 자재를 수출하면서 한 때 엄청 부유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이 국가를 검색해 본 결과 1960 년대에 미국보다 잘 살았다고 합니다.

수입이 엄청 많다 보니 국가에서는 교육이나 의료 시설을 모두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세금 또한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1 년에 1 억씩 보조해주고 유학비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사소한 것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이 국가에서 생산하던 자원이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고 재정을 남발하던 이 국가는 현재 국민소득이 2500 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재정을 낭비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 또한 이 정도의 복지정책은 아니었겠지만 비슷한 사례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복지는 필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복지를 남발하게 되면 나우루 사례나 남유럽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 남유럽 사례를 보면서 복지병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복지는 국민들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토론 전에 복지병 사례에 대해 검색해 봤는데 한 때 영국이 복지병에 나라가 흔들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때 세계를 제패하던 영국이 지나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다가 많은 국민들이 복지병에 빠져 나라 경제가 추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철의 여왕' 마가렛 대처가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마가렛 대처의 강경한 정책과 리더십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마가렛 대처의 리더십을 배워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아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 이대로 선심성 복지 정책을 쓰게 된다면 남유럽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 또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유럽 사례를 보면서 금전적인 복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박동민(경희경영 3) : 저는 우리나라가 남유럽처럼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성실하기 때문에 복지를 제공한다고 해서 복지병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지나친 선심성 복지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복지를 제공하다가는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제 2 의 IMF 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럽 국가의 복지 정책 실패 사례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 복지 정책을 세울 때 참고한다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성현(경희경영 3) :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복지 국가의 성공 사례를 꼽으라면 북유럽 국가를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나왔듯이 북유럽 국가들도 남유럽 국가나 영국 사례처럼 복지병에 시달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쓴 칼럼에도 나와있듯이 스웨덴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복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전적 복지와는 다른 개념의 복지인데, 남유럽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보겠습니다.

박동민(경희경영 3) : 복지 정책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 정책을 꾸준히 쓰면서도 오랫동안 선진국 대열에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복지를 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복지 정책의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유럽 국가에 비해 복지에 대한 개념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시행착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복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게 맞는 복지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 '일하는 복지'는 우리나라에 정말 어울리는 복지 형태라고 봅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복지 정책을 쓰면 경제 성장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많은데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북유럽과 비슷한 복지 수준으로 올리긴 힘들다고 봅니다.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지금 시급한 것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증세 등의 증세라고 봅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세를 했다는 자료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들 국가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높은 상황입니다.

세금을 올리되 국가의 성장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복지'가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복지는 아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효(경희경영 3) : 저도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단, 사회기반시설이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언급되었던 '국가장학금' 사례처럼 증세를 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복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낭비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북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좋다고 무조건 따라 하다가는 자칫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조건에서 복지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철(경희경영 3) :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복지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0 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뤄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은 올라갔지만 아직도 잘 못 먹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부도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에 연연해 복지정책을 세우지 않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보편적 복지는 우리 후세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

임성현(경희경영 3) : 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복지가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고 어려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토론을 계기로 앞으로도 복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⑫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왼쪽부터 김광래(재무금융4), 한정호(재무금융4), 정명진(사학4), 신동철(정치행정학3)

김광래(재무금융 4): 78 회 월례토론회: 증세 없는 복지의 과제: 복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주제로 해서 오늘의 주 토론주제인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복지의 정착' 에 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분께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아가면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정치행정학 3): 저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세제개편안 정책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언론의 질타를 받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부자나 대기업 감세는 놔두고 월급쟁이들만 쥐어짜는 세제개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야는 조세 형평성을 지켜나가면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쪽으로 조세정책의 큰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증세는 없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 확대에 5 년간 들어갈 재원은 무려 134 조 5000 억 원이나 됩니다.

이런 엄청난 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를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호(재무금융 4): 저도 신동철 학우님과 같이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기 보다는 복지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세를 위해서는 먼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고는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 조원가량 줄었는데 그 중 거의 절반 정도가 법인세수 감소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과다보유자나 고소득 자산가 등 부유층의 세금 부담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의 하향조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게 옳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증세 없는 복지 보다는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정명진(사학 4): 저도 두 분의 의견에 충분이 동의하고 저 또한 증세 없는 복지는 허황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나 법인세 과표 단순화 같은 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미뤄둔 채 미세한 조정에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과세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과세가 손쉬운 중산층부터 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개정안대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근로소득자 4 명 중 1 명은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큽니다. 비단 복지공약 이행 차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날 게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래(재무금융 4): 네 세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세분 모두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너무 똑똑히 말씀하셔서 정리하기가 매우 힘드네요

일단 세분의 공통된 의견은 국민들을 현혹하는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기 보다는 복지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 보자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할게 많아 보이시는데 이 논점을 토론하기 전에 오늘의 주 주제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복지의 정착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증세 없는 복지에 관한 칼럼을 작성하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소개되는 북유럽이나 영국은 세금이 매우 무거운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가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키며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돕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한국보다 복지정착이 더 잘되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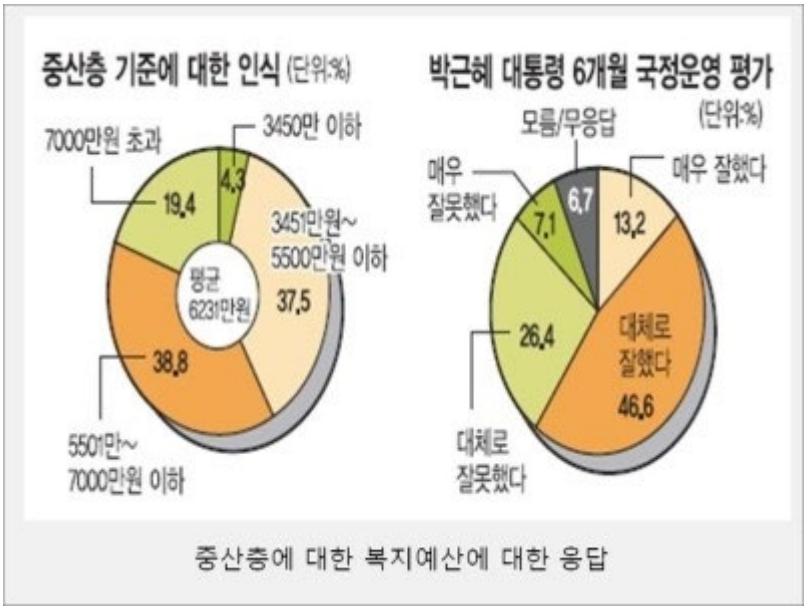
신동철(정치행적학):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차이점이 복지의 정착에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인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는 독일, 영국, 프랑스 정도이며 나머지 국가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세율도 우리나라 보다 높습니다.

경제적부를 쌓아둘 시간이 없었고 1 만 달러선까지 올라오는데 해방 후 50 년이 걸린 한국과 2 차 대전 후 2,30 년 만에 올라온 유럽국가들의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당 생산성이 작고 여가 시간이 적은 2 차 산업이 베이스인 한국과 이미 금융 등 3 차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넘어 간지 오래인 유럽국가들, 특히 유럽은 상호간의 무역장벽 및 문화적 장벽이 낮아 경제적으로도 상호보완이 쉽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란 것도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와 저들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도 있고요, 복지문제에 있어 세금납부 계층과 복지수혜층의 숫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미 1 인당 소득이 8 만 달러대임에도 1 천만 언저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를 가진 나라들이 많죠, 우린 당장 수혜받을 인구만 2000 만 가까이 되는 거고 당연히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혜택이 그들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에 대한 복지예산에 대한 응답

이렇게 혜택을 적게 줄 거면 정말 필요성이 큰 계층에 집중적으로 몰아줘서 경쟁의 기회와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 전체재정을 고려했을 때 우리만의 특수한 변수인 통일 예비금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20 년 정도면 어떻게든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2500 만까지 감안해서 재정적인 대비가 되어야 되는 게 저들과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입니다. 독일만 해도 통일 이후 복지 급여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경제적으로도 서독 시절만큼의 힘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정명진(사학 4): 근데 저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국가들 같은 경우엔 전쟁직후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전쟁직후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고 법제화가 되었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력의 이유로 복지확충을 못한다는 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 부문을 키워야 할 때인데 복지가 발달된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정도죠 따라서 복지지출을 늘리면 자연스레 사회서비스 분야가 발달될 것이고 이것이 고용으로 이어짐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1 인당 국민소득과 공공 사회지출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소득이 비슷했던 때, 유럽국가들은 우리의 3 배 정도를 공공사회지출에 사용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그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동철 학우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매우 많은 분들이 의료서비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와 같이 1 인당 평균 1 만 1 천원만 더 내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동네병원은 80%, 입원진료를 받는 대학병원은 90%까지 올릴 수 있는 의료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다양한 비용측면에서 그들이 실행한 7,80 년대와 현재는 전세계적인 자원의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그들이 사용한 비용의 50% 정도는 더 잡고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금 올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세율이 높으면 경제적으로 경직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각국정부의 통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FTA 다 해서 자본의 흐름을 막을 수단이 전혀 없죠, 즉 세율 증대로 더 많이 내야 할 고소득 대 자본이 해외로 옮겨가는 폐해가 있다는 거죠.

신동철(정치행정학 3):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실직적으로 우리랑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구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적죠 5000 만의 인구인 우리가 1000 만 언저리의 북유럽 국가들의 방식을 따라가기엔 상황이 너무 다르죠 저들은 우리보다 전쟁으로 초토화 된 적도 없는 곳이구요.

결국, 비교대상은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 이들은 이미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기존에 쌓여진 부가 있던 나라들입니다. 독일, 프랑스가 전쟁으로 파괴되었다지만 그들에겐 지식이란 자원이 이미 있었기에 20 년 만에 1 만 달러에 오르고 복지라는 대 협의가 성숙된 것이고 우리나라는 공업기반이 북한지역에 대부분 있고 이제 막 농경기반을 벗어나려던 국가였기에 90 년대 중반에 들어서 1 만 달러에 도달했죠 OECD 평균은 가이드 라인이지 절대적 오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정호(재무금융 4): 분명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그들의 복지, 복지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가 상위권 자들의 탈세협의 조사와 증세 증가 는 분명 우리나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제대로 정착이 된 나란지 의심이 되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잘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유연하게 복지정책이 흘러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과의 차이점이 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7,80 년대 유럽국가들이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던 배경에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으로 인해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재화를 꾸준히 소비해줄 미국이란 존재가 있었기에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 없이 복지재정을 늘려갈 여력이 충분히 되었던 거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소비를 해줄 시장이 없죠 중국은 미국 정도의 소비력을 갖지 못하죠 즉 전반적인 상황이 그 당시와 상당히 달라졌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거죠 일단 선별적 복지로 시작해서 서서히 수혜대상을 늘려가는 게 더 현실적이죠.

또 다른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사실 현재의 영국을 보편적 복지 국가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많이 변했죠) 처음 복지를 시작했을 땐 전쟁 직후의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점점 복지확충이 이루어졌고요. 한정호 학우님 말씀처럼 유럽 국가들의 경우 좌파정당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복지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간 건 사실입니다.

시민사회가 정부에게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1,2 년 안에 타협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유럽국가들의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정명진(사학 4): 복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보단 그렇지 않은 계층이 재화를 더 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국내에서 더 강해진다는 것이 문제죠. 빈부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금 기회의 평등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기회를 살릴 기초체력을 갖지 못한 층이 많은데 선별적 복지는 일종의 핸디를 고소득층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이중과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핸디를 감수하는 것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보고요. 사실 어찌 보면 soc 투자도 보편적 복지의 일환입니다. 교통여건이나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우린 보편적 복지에도 힘을 쏟고 있는 거고요.

대중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이용률이 높은 곳들을 더 좋게 하는 거니까. 국민필수교육과정도 그렇고, 발은 일단 들여 놓은 상태인데, 보편적 복지의 효용을 늘리려면 고소득층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율뿐 아니라 복지혜택을 양보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상자 에겐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식으로요. 그런 국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죠.

신동철(정치행정학 3): 두 가지 정도 짚으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란 거죠 이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부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하나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가져야 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 더 짚자면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보단 그렇지 않은 계층이 재화를 더 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국내에서 더 강해진다는 것이 문제죠" 보편적 복지의 목적 중 하나가 그렇지 않은 계층에 재화소비를 이끌어 내는 건데요? soe 투자는 일본 예 들으면 조용히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결국 soe 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명진(사학 4): 제가 말한 재화는 복지재정을 말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각종 보조금이라던가 국가차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여태까지는 소득 상위계층은 대학등록금을 낼 때 장학금 수혜기준에서 최후순위였는데,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되면, 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층마저 지원해주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재정이 더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죠.

국가장학재단 차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현재 소득분위로 기준을 나눠 가족의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후 순위에 위치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던 계층에까지 돈을 쓰게 됨으로써 정작 필요한 계층에게 갈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신동철(정치행정학 3): 보편적 복지의 효용을 늘리려면 고소득층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율뿐 아니라 복지혜택을 양보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상 자에겐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식으로요. 그런 국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죠.

국민의식의 전환도 맞고 세율뿐 아니라 복지혜택을 하는 것도 맞는데 복지혜택과 양보와 연급지급을 제한한다는 건 형평성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 같네요. 보편적 복지를 사회 안전망을 바라보시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이라 생각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정명진(사학 4): 지금 나오는 반값등록금은 국가 보조금식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식으로 하게 되면 굳이 비교 했을 때 중소기업에만 주던 지원금을 삼성그룹계열사까지 받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안 써도 될 비용까지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SOC 의 경우 물론 수요공급이 주요 원인이긴 하죠. 그러나 SOC 확충이 될 경우 그 혜택은 중산층 이하 층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죠.

서울외곽 순환 버스노선을 증편함으로써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도시들간의 거미줄 식 연결이 가능해져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성남에서 일산으로 일산에서 의정부로, 부천에서 성남으로 등 노동자들의 편익도 증대된 거죠.

사회안전망은 국민들 개개인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주요목표이기 때문에, 한정된 복지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개인소득이 있는 연금수령대상자에 대해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여분이 생기면 그 돈으로 소득이 정말 없는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독거노인에게나 이건희 회장에게나 똑같이 국민연금수령대상자로서 금액을 주는 것보다, 이건희회장처럼 개인소득이 있는 고소득 수령대상자 지급을 제한하고 독거노인같이 정말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120 만원씩 주는 것이 사회 정의에 더 맞는 배분이겠죠?

한정호(재무금융 4): 그러나 SOC 가 확충이 될 경우 그 혜택은 중산층 이하 층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죠. 서울외곽 순환 버스노선을 증편함으로써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도시들간의 거미줄 식 연결이 가능해져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성남에서 일산으로 일산에서 의정부로, 부천에서 성남으로 등 노동자들의 편익도 증대된 거죠.

soc 확충이 주는 편익이 서민중산층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에서 빠를까요? 아니면 보편적 복지를 통해 이루는 예를 들면 반값등록금을 지원을 통해 가는 것이 빠를까요? 제 주변에만 봐도 거의 지금 한달 일해 한달 먹기 식입니다. 가계부채, 물가 상승률만 봐도 아시고 다시 말해 현재 가처분소득 거의 땅을 치고 있죠.

신동철(정치행정학 3):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걷기 위해 전세계 많은 정부가 고민 중 이지만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올리게 될 경우, 다국적화되고 무역장벽이 낮아진 국제시장상황상 메뚜기처럼 본사를 옮겨 다니면서 절세 테크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법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에서. 프랑스의 예를 들면 이번에 소득세 누진구간을 강화하면서 루이비통회장의 벨기에로의 이전까지 일어날 만큼 잡아내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에게 더 걷는 만큼 기업들이 제품가격에 반영 시켜버리기 때문에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구요.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국민적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광래(재무금융 4): 네 토론이 너무 과열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까지 북유럽과 한국의 복지를 비교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잘 정착된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현재의 한국의 복지를 비교하면서 주제가 너무 방대해진 느낌도 있고 과열되는 느낌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의견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복지뿐 아니라 국가 안팎으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인구, 경제사정, 세계흐름을 잘 분석해주시면서 여러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논점으로 순서 없는 무상복지가 위에서 문제점으로 언급 되었는데요 이 논점에 대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정호(재무금융 4):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순서 없는 무상복지는 퍼주기 밖에 안됩니다.. 지금은 무상과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기 전에 사회 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게 먼저죠.. 그냥 복지라는 좋은 말과 하기 쉬운 일들만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관이 너무 강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 인재들은 더 공무원으로 몰릴거고 결국 부패할겁니다.. 지금 재벌만이 문제가 아니라 재벌과 관이 결탁한 게 문제입니다.

신동철(정치행정학 3):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첫째로 OECD 국가들 중 상당부분은 이미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나라들인데 그 국가들과의 비교는 선언적 의미만 가질 뿐 남들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좋아질 확률이 높으니 일단 시작해보자 식의 정책은 부작용만 남을 겁니다.

둘째로 OECD 국가들이 1 만 달러에 도달했을 시기 전세계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그 당시 1 만 달러가 넘는 국가는 지금의 3 만 달러 이상국가 정도 밖에 없을 겁니다..계속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이 지금도 선진국인 거죠.. 여기서도 비교할 대상이 틀렸다는 점 얘기하고 싶습니다.

셋째, 지금 현재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성장률이나 재정이 우수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 밖에 많은 요인들을 무시하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국가로만 구별하는 것 또한 큰 위험요소죠.

넷째, 유럽과 미국은 경제불황을 세계대전을 통해 해결했다는 점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냥 폐허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넌센스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국가로 나눠 평가한 것이 오류이고,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지금 하는 식의)를 했을 때 위에 이야기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시장실패를 이야기하는데 더 정확히는 금관이 결탁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 또한 선별적 복지를 이미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가 더 모럴해저드를 일으킨다는 말도 넌센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이 너무 강합니다.. 여기서 관에 더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한다면 실패할 것이고 결국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진영은 정확히 자기노선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북 유럽식 복지를 원하는지 사회주의로 돌아가길 원하는지.. 이 부분 정말 헷갈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강한 의지와 표현이 필요할 겁니다.

정명진(사학 4): 이번 논점에서도 자꾸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점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보편적 복지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은 30~40%에 이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 정도에 불과하죠. 북유럽국가들이 보편적 복지 시행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높은 조세 부담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평균(25%)에 못 미치는 조세부담률이지만 우리나라 소득은 OECD 국가의 80%수준이므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래(재무금융 4): 네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저는 우리나라 복지가 한국형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유럽 국가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주 주제라 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북유럽국가에서 보편적 복지가 가능했던 것은 북유럽국가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적합하고요. 그러나 복지의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지의 확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국가들의 장단점을 신중히 분석한 뒤 우리나라 형편에 맞는 한국형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오늘 무척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논점으로는 무상복지에 대한 의견들을 돌아가면서 이야기 해보았고요. 대부분 무상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과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고, 두 번째 논점인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복지의 정착 그리고 북유럽과의 비교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주 주제인 만큼 열띤 토론이 되었네요. 또한 인구, 경제상황 등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화끈한 논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논점인 순서 없는 무상복지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한국에 맞는 한국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 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의 허와 실

⑬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민정(동아국무 3): 귀한 시간 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복지문제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전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과거에 비해 국민소득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심해졌고 이제는 경제성장보다 성장한 것을 분배하는 복지정책이 우선과제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의 과제 복지의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낙현(부경경제 3): 증세 없는 복지 최근 가장 많이 들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 정부가 공략한 복지정책 중 아직 실행이 못된 것도 많습니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문제도 국가 예산의 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마른 수건을 짜내기 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른 수건을 짜낸다 한들 물 한 방울 나오지 부족한 예산을 짜낸다고 복지재정이 마련이 될까요?

마른 수건 짜내기 식으로 복지예산을 마련하다 보니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GDP 대비 법인세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세금을 쥐어 짜내기보다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호준(부경경제 3): 저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 됩니다. 현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지출구조조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일년에 10 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예측일 뿐이고 걷어들이는 비용을 제하면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

지출구조조정 또한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정부들은 그럼 아끼지 않아서 복지를 못한 것일까요? 내년 정부 예산을 보니 350 조 중에서 100 조원을 복지에 지출 할 것이라고 하던데 국가 재정의 3 분의 1 을 복지지출로 쓰면 나라 살림이 잘 돌아 갈까요?

복지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를 늘리는 방안은 복지에 돈을 쏟아 붇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성장시켜 낙수효과를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곽성원(부경경제 3): 신호준 학우의 의견처럼 돈을 추가로 거두어 들이는 것 없이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복지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은 상류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고 국가는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계층은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도덕시간에도 배웠듯이 이제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베풀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류층들이 노력을 하여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서민들의 소비나 도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윤정(동아국무 3):또 복지정책에 있어서 선별적 복지이냐 보편적 복지이냐에 분분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자면 삼성그룹의 회장의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적합한 기준을 세워서 선별적인 복지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동아국무 3): 저도 우선 선별적 복지가 된 후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집은 먹고 살만한데 저는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지만,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제 친구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선별적 복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에 따른 기준마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민정(동아국무 3): 여러분들의 복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증세 없지는 복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셨고 보편적 복지보다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기초연금입니다. 노인빈곤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 됩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 복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곽상원(부경경제 3): 저도 복지의 가장 우선과제는 노인복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인복지 문제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령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노인문제를 복지에만 의존 하는 것보다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기존의 실버타운은 요양병원처럼 하나의 건물이거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실버시티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생산의 주체가 되고 소비의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현(동아국무 3):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온 고령인구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으면서, 노인들의 역할 상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노인들은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자신을 찾아주는 곳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노인들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에서는 초반에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초반에는 돈이 들지만 노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는다면 앞으로 노인들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내면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조낙현(부경경제 3): 복지자본주의라는 말이 생겨난 것처럼 복지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유럽국가에 관해서 영상을 보았는데 그 국가에서는 노인들을 생산적인 인구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마다 직업교육기관을 만들어 실직자들과 노인인구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사회에서 제 역할을 잃은 퇴직자들이나 노인들에게 직업 교육을 받게 하여 그들을 생산 가능한 인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힘들지만 미래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준(부경경제 3):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해 지급하는 현금복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 년간 60 조를 투자하여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인들의 삶을 증진시킬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공짜로 60 조를 나누어 주는 것보다 노인들의 자신의 능력을 찾아 제 2 의 직업을 찾을 수 있게 직업교육기관 등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복지 정책은 이제까지의 정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향후 늘어날 고령인구를 대비해서 노인복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자료를 보니 2060 년에는 노인인구가 40%가 될 전망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 정도까지 가는 고령사회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해지는 원인에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저조한 출산율 문제도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무상보육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늘려 급격한 고령사회를 막아야 합니다.

이윤정(동아국무 3): 네 저도 신호준 학우님의 의견처럼,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현금복지를 해야만 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앉아서 자료만 보고 판단하시는데, 직접 발로 뛰면서 어떻게 해야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 노인 빈곤을 줄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지현(동아국무 3): 노인들이 빈곤하고, 심지어 노인 자살률까지 증가하는 것은 노인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의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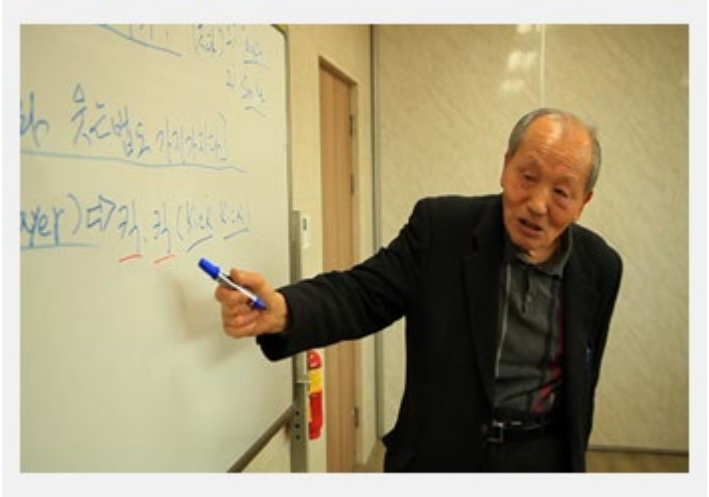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는 노인문화회관, 노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강연 같은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을 사회인구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람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기업에 종사하던 고학력 퇴직자들은 대기업의 인재상과, 업무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대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역경과 고난을 극복했는지 등을 설명해주는 강연을 해주는 활동도 좋지 않을까요?

신호준(부경경제 3): 앞으로 노인인구가 더 많이 증가할 텐데, 이 문제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무리 아닐까요? 국가에 모두 의존하려고 하니까 재정적자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해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동아국무 3): 네 저도 신호준 학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은 경험을 가진 노인들은 자신의 노하우로 창업이나, 사업을 하였을 때, 청년들보다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을 고용한다면 청년들은 그들에게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노인들은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얻을 수 있어 나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민정(동아국무 3): 네, 정말 감사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와 복지의 우선과제까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었던 의견들이 곧 다가오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은퇴문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정부의 정책, 제도적인 기반과 개인의 노력이 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구모임에서는 현금복지보다는 서비스복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노인들을 생산인구로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급격한 고령화를 막기 위해 출산정려정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참여해주신 동아대, 부경대 학우님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⑭ 부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수창 (부산신방 4): 먼저 바쁜 시험기간인 와중에도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에 관해서 토론을 해 볼 것인데요.

흔히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북유럽식 복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승찬 (동아경영 4): 저는 복지의 롤모델이 북유럽식의 높은 수준의 복지라는 것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복지가 북유럽식 복지임에는 동의합니다. 최종 목표가 북유럽인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1 년 예산 차이가 4 배가 넘습니다. 솔직히 말해 인구 규모가 프랑스와 북유럽과 비슷하긴 하지만 예산 차이가 왜 그리 심하게 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돈을 그만큼 벌지 못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다들 미디어를 통해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출되는 예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국민 예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설쳐대고 있습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저도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북유럽의 복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잘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다른 복지도 잘된 것이 많겠지만 우리 생활에 접목시켜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북유럽 국민들은 국민 모두가 국가의 예산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급식이나 대학교 등록금까지 전부 국민 복지로 이루어집니다. 대신 물건값에 Tax 가 많이 붙기 때문에 물가가 비싼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지요.

김승찬 (동아경영 4): 간단히 말해 그 나라가 예산을 벌어들이면 국민 전체에게 투자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 자체가 상당히 부유한 나라에 속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 대강을 들 수 있지요.

도경철 (동아경영 1): 북유럽 식의 고복지가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겠는데요?

김승찬 (동아경영 4):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우리 나라 지금 예산에서 2 배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고복지 국가' 라는 구색이라도 갖출 수 있다고 보면 되지요.

도경철 (동아경영 1):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의 GNP 가 그렇게 높을 수 있나요? 자금력 때문인가요?

김승찬 (동아경영 4): 그렇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북해에 묻혀 있는 유전을 발견한 이후로 더욱 더 국가 소득이 높아지게 되었고 다른 나라들도 제가 보았을 때는 2 차 세계 대전 때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고, 그 당시 기술적인 100~200 년 정도 인프라까지 구축된 상태였습니다. 사회 분위기 자체도 부의 축적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었다기보다는 골고루 분배가 잘 이루어졌기도 하고요.



도경철 (동아경영 1): 제 생각은 북유럽에 대한 복지 제도가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되는 것이 거의 다 국민을 위해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을 시행하려면 하려면 증세에 앞서 탈세를 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철환 (동아경영 1): 저도 북유럽 식의 복지를 지향하는 맞는 건 같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무작정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북유럽과는 무엇이 다른가를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또 생각하기에 국가에서 투자하는 것도 좋긴 한데 국민 1 명에게 좀 더 신경 쓰는 것, 세부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소득 수준에 고려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찬 (동아경영 4): 우리나라 복지가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좀 강하긴 합니다. 제 생각은 최종 목표는 북유럽 식이지만 그러한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먼저는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쓰는 예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30 조~40 조나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자본이 약 7000 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북한 인구가 2000 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인구가 낮으니까 오히려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비해 자본의 축적은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북한과의 통일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찰 같은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감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감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경철 (동아경영 1): 재산에 대한 감찰도 있고 비리에 대한 감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감찰 권력이 그리 세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찰하는 사람이 뒷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층에 비리에 대해 자신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승찬 (동아경영 4):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북한의 군 수뇌부는 제 생각이긴 한데 통일을 이룩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만일 통일을 할 생각이 있다면 적화통일이겠죠.

너무 어정쩡하게 휴전상태로 오래 지냈기에 언젠가는 한 번 더 피를 볼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은 반드시 구출해야 하는 형제이지만 북쪽의 군 수뇌부는 무슨 수를 써서든 국제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지난 2010 년 3 월의 천안함 사건과 11 월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보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즉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때보다 더한 행위를 저지를 위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유럽의 복지 지향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 더 섬세한 제도적인 확립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승찬 (동아경영 4): 내부의 적부터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의 적이 예산을 엉뚱하게 쓰게 만들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그 법으로 인해 국민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자신들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장철환 (동아경영 1): 저는 북유럽의 복지를 지향하되 우리 예산적에 실정에 맞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지하 경제를 비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승찬 (동아경영 4):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부채입니다. 500 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1 년 버는 것보다 2 배가 나라 빚인데 이것이 이상하게 변하면 IMF 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MF 는 국민 빚 문제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사고를 친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밀접하게 발견할 수 있는 주제인데 바로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제도입니다. 반값등록금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많은 대학생들에게 당장은 시행되었으면 하는 정책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국가장학금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2 년부터 매 학기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이 우리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승찬 (동아경영 4): 먼저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국가장학금 제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제도이긴 하지만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그나마 잘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승찬 (동아경영 4): 그것도 있지만 제가 사실 그 혜택을 자주 받고 있지요.(웃음) 여기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혜택을 많이 주고 예산만 더 확보한다면 좀 더 완벽한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제 2 장학금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제 2 장학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김승찬 (동아경영 4):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을 위한 제 1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제 2 장학금은 집에서 나와서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또 제 3 장학금을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지금보다 혜택을 좀 더 늘리고 지급 계층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군요.

김승찬 (동아경영 4): 네 그렇습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분류도 정확할 뿐만 아니라 예산 확충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도 중요하지만 예산 관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지요.

장철환 (동아경영 1):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는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국가 장학금의 분류 기준을 지금보다 더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찬 (동아경영 4): 그리고 반값등록금이든 국가장학금이든 시행하기에 앞서서 상당한 예산이 요구된다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 드렸지요? 현실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부 안 하고 혜택만 단순히 누리려는 사람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겠지요.

도경철 (동아경영 1):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저소득층을 위한 것, 두 번째로 대학을 진정으로 성실하게 다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성적우수자라던지 대외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세 번째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소년 소녀가장을 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김승찬 (동아경영 4): 비슷한 맥락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 조선에서 뉴스 보도를 했던 것을 다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40 년이면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65 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정도로 이 현상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은퇴한 노인을 다시 일자리로 복귀시키고, 잉여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자립형 복지'라고 하지요. 여러분은 이러한 '자립형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승찬 (동아경영 4): 그 전에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도경철 (동아경영 1): 저는 이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저 또한 뉴스에서 우리 나라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인구의 노인이 계속 일을 안 하고 우리가 내는 세금의 연금으로만 살아간다면 젊은 층의 부담이 너무 가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찬성은 합니다. 방금 나온 것처럼 임금을 좀 낮게 주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생산성이 높으신 분들은 많이 받겠지만 적게 받는 분들은 적게 받겠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국회의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노인 분들인데 그 분들은 국가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 은퇴하면 너무 연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사망 시까지 1000 만원에 가까운 연금이 다달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생산에 기여하는 대비 너무 많다는 것이 일종의 부조리이지요. 오히려 근로하는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게 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임금을 높게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생산성이 전혀 없으신 전직 국회의원 분들이 피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장철환 (동아경영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저 또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일이 너무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삶을 비관하고 자살한 사례를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노인들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놀면서 소비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고령화 사회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게 좀 더 나아지면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찬 (동아경영 4): 하지만 그것도 돈이 꽤 듭니다. 전 세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프랑스인데 여기에 1 년에 우리 돈으로 100 조 단위라는 천문학적인 수치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샤를 드 골 대통령 때부터 이것이 시행되었고 꾸준히 무역 흑자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백조씩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던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철환 (동아경영 1): 그런데 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추세가 아닌가 합니다. 의료 기술도 발달되고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하려 하는데다가 출산을 해도 정말 오래 삽니다. 노인 인구만 양산하는 꼴이 됩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김승찬 (동아경영 4): 하지만 거기에 부합하도록 출산율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인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임산부에게 하는 대접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모든 가정이 세 명씩만 낳아도 인구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입시와 학벌지향적인 교육 제도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막고 있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 제도의 결과물이 바로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국가 예산을 횡령하는 비리 권력층들입니다. 교육을 고쳐야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도 늘어나고 나라가 살고 통일을 이룩하여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로 경제, 두 번째로 교육,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적인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교육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적 자원을 형성하는 데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해야 임금도 오르고 출산율도 오릅니다.

두 번째로 제도를 말씀 드렸는데요.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그 많은 돈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 제도의 부조리 또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김승찬 (동아경영 4):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결해야 인구도 늘고 문화 산업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열에 센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이 일제 시대에 많이 뺐겼으니까요.

김승찬 (동아경영 4): 교육열이 높은 것은 좋습니다. 교육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교육열이 심한 것을 이용해서 각종 학원들이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이 생기고 대학 등록금도 우리나라의 비싼 등록금 또한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까요?

김승찬 (동아경영 4):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자본은 너무나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 나오는 결과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도경철 (동아경영 1): 한국 교육은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공부 잘 하는 사람들만이 실제로 근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는 경제 발전, 두 번째로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찬 (동아경영 4):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률을 전면정비함으로써 공금을 횡령하고 예산을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공식화하고, 복지에 쓰이는 예산 중 스스로 자립 가능한 있는 부자한테 쓰는 비용을 줄이고 정말 일어서고 싶고 시작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편성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김수창 (부산신방 4): 오늘은 '복지의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던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작지만 소중한 의견들을 통해서 의식 변화를 이룩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험기간임에도 장시간 수고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2013 년 10 월 15 일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⑮ 강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한결(일본학과 4):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 중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증세 정책을 내고, 여론이 좋지 않자 복지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는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증세 없이 복지를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박유정(교육학과 4): 연구 모임 오기 전에 생각을 해보았는데, 증세 없이 복지를 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지(정치외교 4): 저 또한 증세 없이 복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운영하는 모든 자원은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체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국민에게는 많은 세금을 걷고 공장이나 산업 시설의 경우 낮은 전기료를 내는 등 기업이나 산업시설에 걷는 세금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박윤지 학생의 이야기처럼 만약 산업시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지면 그만큼 생산비가 비싸질 텐데 오히려 소비를 낮추고 경제를 축소하는 길이 아닐까요?

박윤지(정치외교 4):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적은 세금을 내는 대신 국민들에게도 그만큼의 돌아가는 몫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절약만을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박유정 학생은 증세 없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박유정(교육학과 4): 저도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복지 정책도 말이 많은데 증세 없이 복지를 시행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지(정치외교 4): 우리나라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면 그것으로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증세 없이도 복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자원 없이 순수하게 인적자원뿐인데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를 한다는 것은 어디서 수입원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미란(일본학과 4): 저도 증세 없는 복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서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한다면 낭비되고 있는 세금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금의 낭비를 파악하고, 줄이는 부분이 시급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그래서 나온 개념이 '서비스 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 복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형태의 복지일 것 같으세요?

박윤지(정치외교 4): 서비스직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박유정(교육학과 4): 저는 토론 전에 서비스 복지에 관해서 조금 찾아 보았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선진화포럼의 블로그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그렇다면 박유정 학생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박유정(교육학과 4): '일자리를 개발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나아가 사회의 가치로 환원되어 경제성장의 일부분으로 창출할 수 있는 복지'가 서비스 복지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으로는 어떤 것인지 잘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제가 서비스 복지와 관련하여 '빅이슈'에 관한 칼럼을 썼습니다. 빅이슈는 홈리스라고 말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사람들이 1300 원을 주고 빅이슈 판매처로부터 잡지를 사고, 3000 원에 되팔아 생기는 수익으로 집을 마련하는 서비스 복지의 한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복지는 많이 원하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복지를 돈이 아닌 일자리를 주자. 노인 복지도 연금과 같이 현금이 아닌 일자리를 주자. 라는 것이 서비스 복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의 역사 해설가와 같이 필요한 일자리 이지만 공급이 적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서비스 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지를 만든다면 서비스 복지 내에서 만들고 싶은 복지 서비스가 있나요?

박윤지(정치외교 4): 빅이슈에 대해서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1300 원에 잡지를 공급받아 3000 원에 되판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을 다 팔지 못한다면 남는 잡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박윤지 학생(정치외교 4)

김한결(일본학과 4): 제가 그 부분까지는 조사하지 못했는데요. 아마도 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홈리스의 몫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윤지(정치외교 4): 이런 손해 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작은 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면, 손해 분에 대해서는 다시 홈리스의 몫으로 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미란(일본학과 4): 그런데 저희 모두가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렇다면 증세 없는 이라는 조건은 빼고 복지를 만든다면 어떠한 복지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박유정(교육학과 4): 위에서 이야기한 서비스 복지의 노인 일자리 중에서 일본의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여행 했을 때, 방문한 어떤 마을이 유령, 귀신으로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야기를 설명해주시던 분들이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셨습니다.

마을의 전설을 설명하는 일은 단순한 봉사 차원이 아닌 시청에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주고, 명함까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 외워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을에서 몇 십 년을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는 실제처럼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미란(일본학과 4): 꼭 노인일자리에 한정해야 하나요?

김한결(일본학과 4):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 유아복지 혹은 청년복지까지 복지의 모든 부분에서 상관 없습니다.

박윤지(정치외교 4): 복지의 주가 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연금에 쓰이는 모든 세금이 청장년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장년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세수에 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생산 인력, 젊은 세대들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복지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의 육아복지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지미란(일본학과 4):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베이비시터'가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수요자들은 적은 돈으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게끔 복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은 벌렸는데, 이것이 실제 수요자와 베이비시터 간에 연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한 엄마들은 베이비시터를 필요로 하고 베이비시터 분들도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연계가 잘 되지 않아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복지 정책들은 많은데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유정(교육학과 4): 복지정책이 입법되고 각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정(정치외교 4): 복지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연금에 대한 신뢰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내가 낸 세금을 미래에 연금으로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연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우선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미란(일본학과 4): 복지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몸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의 문제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저도 그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특히 우리학교의 경우 국립대이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에 대한 열망도 없고, 학생들이 몸소 느끼는 복지 정책이 없기 때문에 복지문제가 청년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미란(일본학과 4): 우리나라는 가정에게 관한 복지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몸소 느끼는 복지는 오히려 적지 않나요?

박유정(교육학과 4): 복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희 언니가 월급에서 세금을 내야 할 때, 흔히 말하는 4 대 보험이 모두 시행하는 공단이 달라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기관을 하나로 하여 융통성 있게 하여 세금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지(정치외교 4): 단기간에, 5 년 안에 실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복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은 복지 정책이지만 집권 정당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존의 좋은 정책들도 폐지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인턴제도의 경우 일자리를 창출하고 업무를 실습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싼 인력으로 잡무의 일자리로 변질되었습니다. 서비스 복지의 일자리도 확실한 보장이 없이 단순한 일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미란(일본학과 4): 길게 보지 않고 당장의 실적만을 생각한 복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세수의 고민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식의 복지정책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정(교육학과 4): 선거 공약에서 많은 후보들이 복지정책을 통해 경쟁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는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닌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하여 후보들끼리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만약 후보 2 명이 나왔는데, 한 후보의 경우 복지 정책이 화려하고 무조건 좋아 보이는 공약인 반면에 다른 후보는 복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측면을 말하고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후보가 있다면 두 후보 중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하실 건가요?

박윤지(정치외교 4): 저는 두 번째 후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지미란(일본학과 4): 저도 두 번째 후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현실성 없는 공약과 실현 가능한 공약을 구분할 수 있고, 그런 것에 혹해 투표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결(일본학과 4): 오늘 연구모임의 큰 주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어떻게 실현 시킬까.'이었지만 토론자 분들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토론의 주제를 바꾸어 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지정책을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한다. 복지 정책들이 실현 단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만든다. 미래의 복지에 대한 확신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만든다. 등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저는 복지가 무엇보다 선거 공약에서 분리되고, 단기간의 실적을 바라는 복지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⑯ 울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정혜진(경찰3), 차은지(법학4), 정주아(법학4), 최해정(경제4)

최정은(정외 3): 지금부터 한국선진화포럼 제 78 차 월례토론회 '증세 없는 복지의 과제: 복지의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를 통해 울산대학교 학생들과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토론자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9 월 선진화 연구모임에 이어 10 월 연구모임까지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선진화포럼께도 감사 드립니다.

최정은(정외 3): 9 월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77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 인성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제 78 차 월례 토론회 '증세 없는 복지의 과제: 복지의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성한 9 월 월례토론회 칼럼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9 월 월례토론회 주제에 대한 저의 칼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는 이유를 국민의 신뢰도 결여라고 보았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대해 논란이 많이 붉어지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실 거에요.

증세 없이 복지를 이행하겠다는 초반의 공약과는 달리 노인기초연금 정책에 있어서 모든 노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공약이 70%만 적용대상으로 삼겠다는 불가피한 공약수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반발이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복지정책이 연일 이슈가 되는 가운데 복지국가와 국민의 신뢰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토론해 볼까 합니다.

최해정(경제 4):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박대통령의 노인기초연금정책에 대한 공약수정은 국내의 재정상황의 악화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곤 하지만,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단순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과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을 들었을 땐, 정말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거구나, 재원마련이 될 곳이 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실에 부딪힌 상황을 보니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세제개정안 때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어서 과연 우리나라가 별 탈 없이 복지국가에 접어 들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정주아(법학 4): 최해정 토론자 의견에 덧붙여 보자면,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에 대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복지라는 개념에 대해 국가의 희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복지선진국들이 무상교육이다 뭐다 다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단면적인 모습에 혹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저 또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봐도 증세에 대해선 반대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조건적인 국가의 희생을 바래서 그런 것보다는 세금을 땅에 버리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 만큼 피땀 흘려 번 국민들의 세금의 출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세금은 나를 위해서 내는 것인데 국회의원 배만 불리는 것 같고, 정작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으니 아까운 맘이 클 것 같아요.

차은지(법학 4): 그 만큼 정부와 국민 사이에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데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하는 국민이 있겠어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을 보면 한 번씩 놀랄 때도 있잖아요. 월급에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보면 아깝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론 불가능하죠.

정혜진(경찰 3): 차은지 토론자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봤을 땐 증세 없는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단순 포퓰리즘성 발언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셨고 이번 논란은 어쩔 수 없었던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공약이 단순 포퓰리즘 공약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장기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공약수정에 대해서도 반발이 많은 가운데 증세까지 감행한다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치 후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주아(법학 4): 증세 없는 복지를 무조건적으로 해야만 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시행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야 하겠죠. 국민들이 증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은 가운데 하루 빨리 이러한 인식을 걷어 내기 위해선 증세 없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니 증세를 하겠다’ 가 아니라 복지정책에 대한 수정을 감행해서라도 증세 없는 복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엔 복지국가가 나라에 돈이 많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그만큼 복지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반값등록금, 무상급식이라는 말에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라가는구나 싶었는데 중요한 건 돈이 아니더라고요.

최해정(경제 4): 맞아요. 일단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선 나라에 돈이 많다는 것과 자원도 빠질 수 없는 요소긴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자원이라곤 인적자원밖에 없는데다가 고령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수혜자는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복지는 증세밖에 답이 없죠. 그러나 국민들이 돈 못 내겠다고 하는데 무슨 복지국가가 되겠어요? 처음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떡해요. 그렇다고 복지를 안 할 순 없죠. 언젠가 증세를 감행해야 할 것이고 그 때가서 또 증세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논란을 바라봐야 해요.

최정은(정외 3): 네 해정 토론자 말씀처럼 이 논란은 단순히 눈 앞에 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는 국민들의 신뢰도가 가장 기초가 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정부가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재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국민의 돈으로 국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인데 국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정주아(법학 3):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도 한 몫 하죠! 저번 연구모임 때 공부를 제대로 안하고 온 것 같아서 좀 알아봤는데요. 스웨덴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발이 없어요. 스웨덴은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계약관계가 아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래요. 멋있지 않아요?

정부의 사고방식 자체가 국가=국민의 집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해요. 따라서 어린이 양육문제도 가정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 라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 국가구요.



사회에 대한 신뢰도에서 한국과 스웨덴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은지(법학 4): 저도 스웨덴 얘길 잠깐 하자면, 옴부즈만 제도의 발상지인 스웨덴은 옴부즈만 제도를 시민단체나 민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담당을 한다고 해요. 행정부를 감찰, 견제하기 위한 기구를 정부가 맡아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국민과 정부의 신뢰도가 강하기 때문이겠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좋은 정책도 중요하고, 재원이 많으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먼저 국민들이 얼마나 정부를 믿고 따라오려는 마음을 가지느냐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스웨덴은 정치의 투명성, 정보공개가 세계 제일의 수준이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거겠죠.

저번 달 토론에서 최정은 토론자가 국격의 3 요소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제성장, 해외의 위상, 사회적 자본 이렇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부족한 것이 사회적 자본인데 반해 스웨덴은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정혜진(경찰 3): 스웨덴은 워낙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스웨덴이랑 비교를 하니 우리나라가 너무 갖추어야 할 게 많아 보입니다. 뭐 스웨덴을 보고 복지국가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한국형 복지국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복지라는 것이 한 나라의 중대사안이기도 하고 국가의 건립과 성장과정이 다 다르며,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접목시킨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이 필요하단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같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더라도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나라마다 같을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번 달 연구모임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 달은 다른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는 모두 사회적자본의 결여에서 발생하는 것 같네요.

인성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든, 복지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든 우리나라 사회적자본의 부족이 모든 사회문제에 빠지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최정은(정외 3): 그렇죠. 저도 포럼활동을 하면서 여러 편의 칼럼을 작성하면서 느낀 것이 결국엔 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게 원인이더라구요. 겉으로 봤을 땐 연관 없어 보이는 사회문제들도 결국은 사회적 자본의 부족에서부터 발생한 문제들도 많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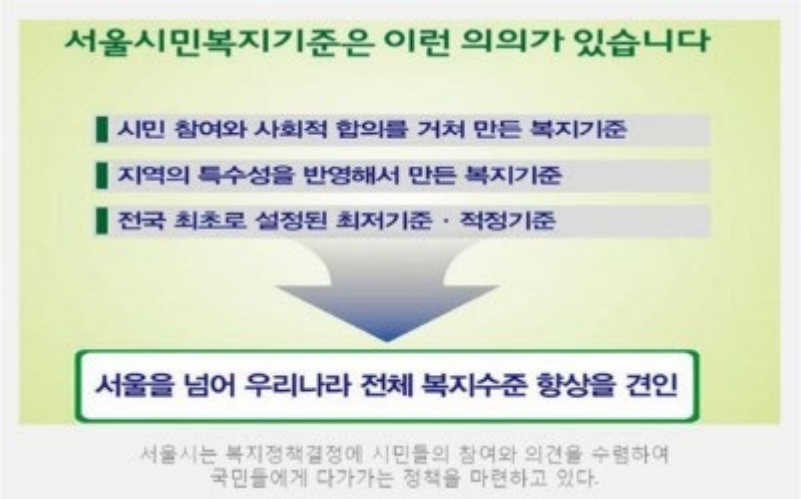
차은지(법학 4): 아무튼, 우리나라 복지문제 해결은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해요. 지금 상황이 참 복지문제에 대해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미 신뢰를 잃은 사건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쉽진 않으니까요.

정주아(법학 4): 근데 제 생각엔 오히려 정부나 국민차원에서 봤을 때 잘만 활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5 년간 135 조원이 필요한 복지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곤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재 수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선별적으로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하루가 다르게 팍팍해져 가는 가운데, 큰 정책이 아니더라도 정말 국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로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죄스런 마음에라도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될 거구요.

국민들도 점점 더 힘든 경제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곳을 긁어주는 정책이 더 값지고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할 때, 서울시에서는 시민복지기준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100 차례가 넘는 단계 끝에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제하다가 보게 된 건데 수혜를 받는 것은 국민이니 국민의 대표, 국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정책을 기획한다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은(정외 3): 네. 서울시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 지 몰랐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처럼 선별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하기 이전에 국민의 신뢰도 회복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의 투명성, 정보공개 등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걱정스럽네요.

이번 노인기초연금에 대한 공약 재 수정에 대한 국민의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도도 많이 잃게 될 텐데요.

하루 빨리 회복하기 위해선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가까이에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해 왔던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선별적인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하여야 앞으로 대한민국도 복지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번 달의 첫 토론과는 달리 좀 더 진지하게 임해주셔서 좀 더 좋은 의견이 오고 갔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 2 회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선진화 과제 31: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제 87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김초아(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야당의 텃밭'인 전라도에서 지역감정을 타파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얼마 전 있었던 7.30 보궐선거, 다들 투표하셨나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의외의 결과가 나온 곳은 단연 전남 순천·곡성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순천·곡성은 본래 야당의 텃밭으로 알려질 정도로 지역감정이 심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6만815표(49.43%)로, 4만9611표(40.32%)를 얻은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26년만에 최대 이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정현 후보가 우리나라의 고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진심'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이의원은 "한국 정치의 문제점인 지역구도와 지역감정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줘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직접 발로뛰며 유권자들에게 어필했고, 결국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희망의 시작이자 정치계의 큰 획을 그은 중대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여전히 지역감정과 이에 따른 지역간 소통의 부재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역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를 위해 지난 24일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월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은 요즘 언론매체들이 지역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지역 간 소통이 선진화되기 위해선 언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대화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근 대전일보 논설위원도 지역갈등을 확산시키는 미디어의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특히 선거 때만 되면 미디어에 의해 정치적 논란과 갈등이 확산되므로 이에 대한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배점모 호원대학교 교수는 특히 지역 갈등이 심각한 영-호남의 경제적 격차가 지역간 소통의 부재를 야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라는 논리보다는 '파이를 잘 나누어서 더 큰 파이를 만들자'라는 논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호남지역화합축제 같은 문화 행사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지역 간 정치적 등용에 있어 차별 없이 지역 간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 토론자들은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해 문제점과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했지만, 최근 젊은 세대에 들어서면서 지역감정의 개념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을 표했습니다.



지역 구도가 잘 나타나는 선거철 우리나라 지도

젊은 세대에 속하는 저 또한 지역감정을 크게 느낀 적이 없고, 점점 이러한 추세가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낄 때는 바로 선거철인데요, TV 나 인터넷에서는 연일 어느 지역에서 어느 당 후보가 얼만큼의 표를 얻을지 분석하는 보도를 쏟아냅니다.

우리나라라는 작은 땅덩어리를 두고 예상되는 당의 색을 칠해보면 특히 영남 호남은 그 색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결과도 비슷한데요, 물론 이 지역감정은 역사적으로 정치 갈등과 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한 갈등 양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를 더욱 더 부추기는 것은 자극적인 미디어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예시로 든 전남 순천·곡성의 7·30 보궐선거 때도 그랬었죠. 서갑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수사의 모든 책임을 전남 출신들이 뒤집어쓰고 있다"며 전남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마저 지난 22일 서 후보 지원 유세에서 “박근혜 정권 들어 요직에 기용된 호남 사람 찾기가 바다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 라며 덧붙였습니다. 자당 후보의 경쟁력이 약한 영남권에서는 지역구도의 타파를 외치면서, 호남 지역에서는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지 않나요?

게다가 이를 보도하는 많은 언론들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정치인들의 한 마디는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웹 상에서도 정치 관련 이야기들이 활발한데요, 이를 접하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알게 모르게 지역감정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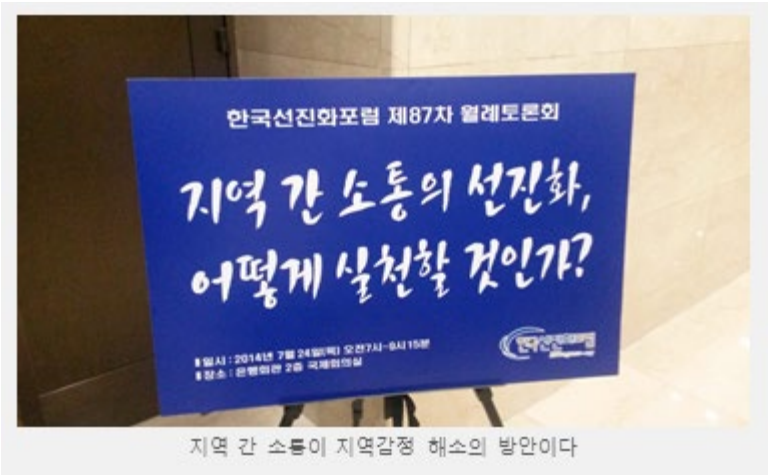
따라서 미디어와 정치인들의 올바른 태도 함양이 필요한데요, 난타전이 되어버리는 선거철에는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죠. 언론의 자유, 소통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를 빙자한 선동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강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미디어나 정치인들의 자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순천 곡성 선거 결과에서 보았듯이 점점 국민들은 지역, 당 색보다는 후보 당사자의 인격과 노력을 볼 것 입니다. 또한 연일 자극적인 보도만을 하는 언론들은 그 신뢰성을 잃고 있지요.

그 동안의 지역 구도를 중심으로 한 방식은 이제 점점 옛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미디어, 선진화된 정치, 더 나아가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1.mbm
2.한국선진화포럼
3.ytn

② 김태준(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지역 간 소통이 지역감정 해소의 방안이다

'지역감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정적인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야 할까요? 저는 이 해답을 알고 싶어서 오는 7월24일에 있었던 한국선진화포럼 7월 월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역축제와 지역 간 교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지역축제와 교류를 통해서 지역 간 소통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지역감정이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감정의 해소 방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역감정이란 지역정서 혹은 지역 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역정서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충성, 소속감을 나타내는 반면 지역감정은 지역에 대한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감정은 3가지 원인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심리적인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역감정의 원인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은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적, 사회심리적인 측면은 여전히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바로 소통과 교류입니다. 우리가 남을 모르는 이유는 남과의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역감정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이 상대방과 교류,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는 진전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다양한 지역축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축제의 이용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중에서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축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호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축제들입니다. '영호남 친선 자전거축제', '영호남 교류 음악회', '영호남 축구 선교축제' 등등 영호남간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다양한 축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오늘날의 사회현상과 결합하여 지역감정을 타파할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주의적 정체성 역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간 소통, 교류는 지역감정의 해소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역축제는 그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축제의 특성 때문인데요. 지역축제는 정기적으로 열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축제는 지역이라는 삶의 터전을 단순히 유흥의 공간으로 격하시킬 수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지역축제만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감정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역감정의 해소에 대해 자매결연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단체가 다른 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지역축제와 차이점은 정기적이지만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교류를 이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초등학교 간 자매결연은 지역감정 해소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자매결연은 특히 공통된 집단 간 결연의 경우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간 자매결연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만큼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부터 교류를 통해 상대를 알게 된다면 자라나는 세대부터는 지역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매결연은 비단 영호남 간에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각되고 있는 지역 간 갈등이 영호남 간 갈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과의 교류에서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한 국가라는 프레임으로 엮어야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지역감정의 해소는 하루라도 빨리 그에 대한 모델이 제시되고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요. 통일이 된다면 분명 북한지역과 남한지역 간 새로운 지역갈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통일된 동독과 서독 간의 갈등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러한 측면에서 다가오는 통일에 대한 대비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야 할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당장의 갈등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통합, 협력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한 시라도 빨리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1. 직접 촬영
2. http://korean.visitkorea.or.kr/kor/inut/where/festival/festival.jsp
3. http://www.youtube.com/watch?v=NRxy_eSmHCM

③ 김현성(이화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과)



전통의 '우리' VS 현재의 '오직 나'

세월호 사고로 인해 드러났지만 우리사회는 점점 너·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에서 살아 숨 쉬던 계·두레·향약에서의 '우리'라는 모습은 점점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너·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의 재발견이 우리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합니다. 특히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7월 24일,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87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간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한 대책,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해 열린 제 87차 월례토론회

먼저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님께서는 주제발표에서 지역 간의 소통이 공공담론 수준으로 선진화 되기 위해서 시민공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토론자중 배점모 호원대학교 교수는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경제적 소통과 교통체계의 균형적인 발전정책, 정치적 등용에서의 균형,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타파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도의 문제점과 선거 후에 일어나는 승자독식 문화의 개선, 국민의 정치적 문해력 제고를 강조하셨습니다.

이홍종 부경대학교 교수는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것과 도를 없애고 도에서 하는 일을 기초단체인 시나 군에서 하도록 바꾸는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재근

대전일보 논설위원은 충청도의 점차 완화되는 정치적 지역갈등을 바탕하에 이성적 가치중립적 투표,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미디어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창우 강원일보 부국장은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문화적 소통의 선진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현수 경인일보 편집국장은 꼴통 보수, 꼴통 진보가 아닌,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여섯 분의 발표에 다 공감이 갔지만 그 중 지역 간 주민들이 만나는 기회를 확대하여 불신과 오해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식을 바꾸는 데에는 지역 주민들간 잦은 노출과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일 직업군에서 이러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부는 농부끼리, 상인은 상인끼리, 학생은 학생끼리 혼자만의 '공부'가 아닌 '배움'을 통한 학습공동체를 구축하는 건 어떨까요? 각 지역 같은 직업인들이 모여 만드는 주체적인 학습을 위한 소통 장소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적극 소속되어 있는 일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고 자발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소속감이 강해 끈끈한 유대감으로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토론을 중심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면 자연스레 질서나 나눔, 배려의 공동체 덕목을 학습하게 되지 않을까요?

공동체의식은 지식적으로 습득하기에 머무르기 보다는 실천과 함께 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시스템 환경에 노출된다면 자연스레 질서, 나눔, 배려와 같은 공동체의식을 학습하고 몸소 실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간 불신과 오해는 점차 줄어들고 나아가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출처>
그림1-
http://rollingdice.co.kr/category/%EB%A1%A4%EB%A7%81%EB%8B%A4%EC%9D%B4%EC%8A%A4%EB%A5%BC%20%EC%86%8C%EA%B0%9C%ED%95%A9%EB%8B%88%EB%8B%A4
그림2-http://maggot.prhouse.net/2307

그림3-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cPsv&articleno=67

④ 류호영(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호남권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당선의 의미

최근 7월 30일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놀라운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흔히 야당의 텃밭이라 일컬어지는 전남 순천시 곡성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9.1% 차이로 제치고 당선된 것입니다.

그는 해묵은 감정을 풀어주는 신선한 바람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이슈가 될 정도로, 실로 이는 역사적인 선거혁명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놀라워할까요?



지역 간 격진(激震)의 진원지, '미디어'

두 개 이상의 지각이 갈라지거나 부딪힐 때 일어나는 지진처럼, 지역마다의 색과 감정들이 서로를 배척하고 충돌할 때 국가는 격진을 겪습니다.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는 지역주의는 오랫동안 망국병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역주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자기 지역에 대한 호감이나 귀속감보다는 타 지역에 대한 배타적 거리감이나 차별의식이라는 설명이 더 강하게 와 닿습니다. 정치의 편가르기와 국가지원의 편차에 따른 경제차로 짙어진 지역감정은 여러 정권과 세대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여전히 지역 간 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영호남 간의 꽉 막힌 소통이 특히 문제입니다. 편견에 지배받는 배타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소통을 막고 있습니다. 지역 간 악감정과 이기주의로 변질된 지역주의는 국가의 경제·정치·사회·문화 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지역주의가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써서 도와주어도 모자랄 판에 소소한 다툼과 오해들을 확대재생산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입니다.



올바른 언론의 역할, '책임 있고 공정성 있게'

미디어는 신문, 잡지, TV 방송, 인터넷신문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뜻합니다. 언론기관들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취재하고 평가하여 사실과 의견을 보도하는 일을 합니다. 또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 대중을 계도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언론은 국가에 대해서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국가권력의 잘잘못이나 오·남용을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조성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또 다른 전통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자본과 국가권력이 언론과 결탁하거나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편향되고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의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여 선동하는 부정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은 당선을 위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정치인과 정치집단보다 한 술 더 떠 앞장서서 지역갈등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지역 사이에 쓸데없는 감정과 대수롭지 않은 다툼 혹은 소소한 오해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미디어의 탓이 매우 큽니다.

정치적 선전과 지역감정 유발을 목적으로 한 보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왜곡·조작 보도에 대한 감시강화와 법적 대응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론이 사회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가 나서서 언론을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론 스스로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면서도 원칙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태도를 지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 발전을 이끄는 거대한 소셜 캐피탈

물론 언론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미디어 종사자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적 자본만이 아닙니다. 그네들이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발전요인이 되기도 하고 저해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의 의지가 더욱 절실합니다. 언론은 단순한 정보 매개체가 아닙니다. 언론이야말로 국가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커다란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충돌을 야기하여 격한 지진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될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훌륭한 교육자가 되는 것이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닐까요? 언론이 국민들에게 성숙함과 바른 이성을 보여주었을 때, 공정한 공공이익이 지향되는 시민공론의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 간 소통의 정상화이며 곧 소통의 선진화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24일 목요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선진화포럼이 주관한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월례토론회에 참석 후 작성한 칼럼입니다.

〈출처〉
그림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401568
그림2) http://www.youtube.com/watch?v=kOZ2UeyfTHg

⑤ 박성찬(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 개최한 제 87차 월례토론회

산업화, 민주화를 걸쳐 선진화 과정에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지역 갈등이라는 과제를 품에 안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오래된 과제를 넘어서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 이에 한국 선진화 포럼에 개최한 제 87차 월례토론회에서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은 전통적으로 시민들의 공공담론은 언론으로 대표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즈음 언론은 국민의 마음을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언론매체들은 시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독립돼 시민사회의 갈등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 보다 오히려 갈등을 더욱 부추기려고 보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김재근 대전일보 논설위원은 쓸 데 없는 지역갈등 구조가 퍼지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전적으로 미디어 탓이라면서 특히 선거 때면 신문방송은 물론 온라인도 온통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으로 갈려 사생결단하듯 싸운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점모 호원대 교수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보면 호남지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면서 소득 불평등과 지역 간 불균형이 소통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파이를 키워서 늘리자'는 논리에서 '파이를 잘 나누어서 더 큰 파이를 만들자'라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언론은 그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필자는 여러 발제자가 제시한 의견 중에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언론의 형태가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항상 중립을 지키며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이 만일 특정 감정을 부추기는 '도구'가 됐을 때 그 폐해는 민주화 과정에서 여실히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을 무엇으로 견제할 수 있을까. 언론 역시도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불구하다. 독자가 외면한다면 스스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언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독자인 시민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한 독자라면 신문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도구로 변질되었을 때 이것을 감지하고 자신만의 대처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신문에 제재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할 경우는 보이콧운동을 펼칠 수도 있다.


언론에게 개인은 단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닐까

물론 개인이 과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언론에게 영향이나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도리어 언론에 장악되어 세뇌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반증을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오래 전부터 야당의 우세가 지배적이었던 순천, 곡성지역에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 이정현 후보가 뽑힌 것이다. 이것은 이제는 언론이 지역감정을 선거에 이용하더라도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더 이상 도구로서의 언론은 그 도구로서의 힘을 잃은 것이다. 이는 옛날에 비해 성숙된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예는 개인이 언론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한가지 방법 중 하나가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언론도 독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묵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언론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항상 제도적인 측면, 처벌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언론이란 이익단체이고 그 이익을 위협한다면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익을 위협하는 방법은 단발적인 처벌이 아니라 바로 독자들의 외면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역감정을 내세우며 인기를 얻으려던 언론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성숙한 시민에게는 단순한 감정드라이브가 아닌 중립적인 언론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말이다.



지역 간 소통을 통한 선진화를 기대해본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변화로 인해 언론은 건강함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지역감정 생산지가 사라짐으로써 더 이상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그 맥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곧 지역감정의 종식 그리고 지역 간의 소통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선진화의 단초가 될 것이다

세번째 그림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0955788

⑥ 손민지(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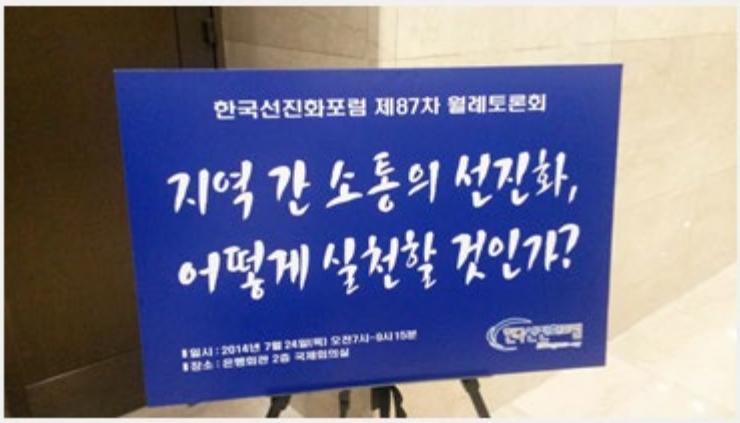
지방 출신 학생들의 좌충우돌 상경기를 그린 <응답하라 1994>

작년 겨울 많은 사람을 열광하게 했던 〈응답하라 1994〉를 기억하시나요? 돌풍 같은 신드롬을 일으키며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 테마는 지방 출신 학생들의 좌충우돌 상경기로, 각자 다른 사투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해당 지방 사람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는 정말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지역감정은 한국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7월 24일에 있었던 (재)한국선진화포럼 제87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성 총장님을 비롯해 대부분의 토론자께서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해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87차 월례토론회

배점모 교수님은 지역 간 주민의 교류 및 방문 확대를 비롯한 4가지 방안을 제안하셨고,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께서는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및 국가발전과 같이 대승적 차원에서의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선도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홍정 교수님은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해 인물, 제도, 문화, 이 세 가지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김재근 논설위원께서는 언론의 역할과 태도를 지적하셨으며, 끝으로 김창우 부국장께서는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와 같이 문화적 소통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전문가분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소통이 지역 간 소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평생학습축제를 통한 문화적 소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미디어를 통해 교류한다면 더 효율적이겠지만, 기성세대는 미디어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적 접근이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때 평생학습축제가 아닌 지역 축제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축제의 획일적인 구성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역축제 방문이 문화적 교류라는 이름으로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친다면 형식적인 대안일 뿐이겠죠.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지역 간 소통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축제는 다릅니다. 지역 간 소통의 장이 형성될 수 있고, 장기적·반복적 행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서울, 파주, 정읍,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로,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시·발표·체험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이처럼 축제의 성격자체가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교육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화적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의 평생학습공동체가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에 파주, 정읍, 인천 등에서 활동하는 평생학습공동체가 참여하는 것이죠. 각 지역만의 전통적인 행사나 놀이 등을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주민들은 타 지역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하면서 서로에게 있었던 지역 간 소통의 벽을 조금이나마 허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평생학습축제를 진행할 경우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선, 지역 간 소통이 국가주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류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지역의 평생학습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의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축제와, 이에 참여하는 평생학습공동체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중앙에만 모였던 주민들의 관심을 지역사회로 돌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 간 소통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이렇듯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티격태격했지만 나중엔 지역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과 우정을 지속했던 〈응답하라 1994〉의 등장인물들처럼 말입니다.

지역감정은 선진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선거를 할 때나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지역에 대한 선호나 혐오에 치우쳐서 결정하니 말이죠. 지역감정은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는 소통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평생학습축제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한다면, 소통의 벽은 곧 허물어지고 나아가 선진국 진입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1. http://www.youtube.com/watch?v=VkM-SdLkiHI
2. http://www.youtube.com/watch?v=xtUHAzgm8ts

⑦ 송동근(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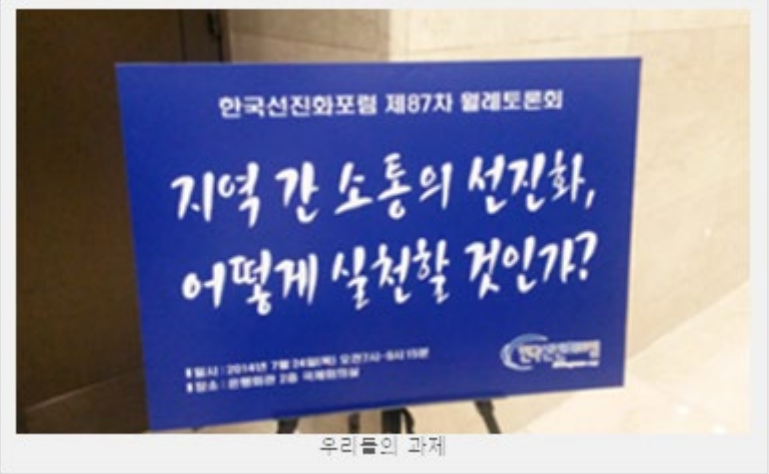


여러분들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 아시나요? "청소년참여위원회"란 16개 시도 청소년 대표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역 간 소통하고 토론하는 기관입니다.

줄여서 '청참위'는 현재 각각의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서로 소통하며 화합의 장을 여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관심으로부터 나온 힘과, 지역의 자랑인 지역축제가 만나 많은 사람들은 지역 간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지역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예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감정 다툼이 그 사례인데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지역을 적대시하고 서로에게 나쁜 지역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철에서도 그 나쁜 사례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각 지역의 사람들이 후보자들을 뽑을 때 공약보다는 지역 색을 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 간 소통이 원만하지 않다는 논리에 증거들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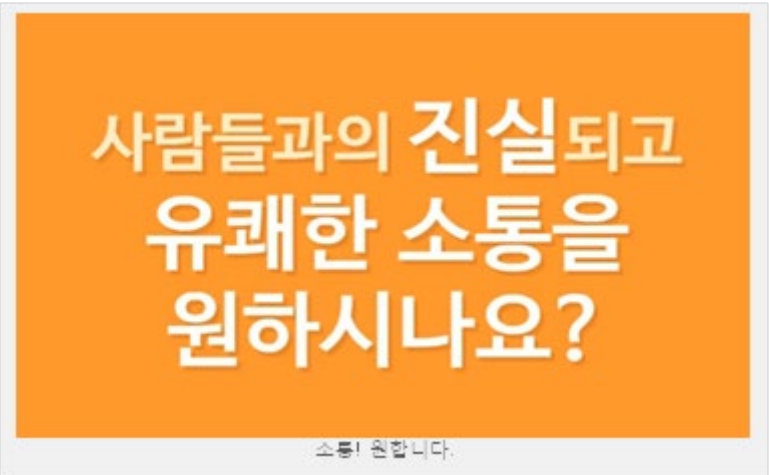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안 그래도 좁고 조그마한 이 나라에서 하나로 뭉치기는커녕 토론할 땐 자신의 지역 우수성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7월 24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각계각층의 사회명사들과 전문가들을 불러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님의 문화적 소통 중요성을 시작으로 많은 토론자분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배점모 교수님은 지역 간 주민의 교류 및 방문 확대와 더불어 경제적 소통, 균형적인 발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께서는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정의 완화를 위해 지역감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선도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더불어서 언론의 역할과 태도를 지적해야 하고, 문화적 선진화를 이루어야 하며 지역갈등 줄일 수 있는 미디어의 중요성, 지역축제 활성화해야 한다 등 많은 의견과 해결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소통! 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바로 알아야 세계 강대국을 이기고 지역 소통을 통해 선진국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과 해결방안을 알고 있습니다. 이젠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지역의 오해를 풀고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국가, 정부, 세계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알려야 합니다. 우리 평범한 학생들은 서울 지역과 지방지역 대학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화합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축제에 적극 참여하며 놀아봄으로써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제대로 느끼면서 신뢰와 네트워크를 구축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점차 실행하고 실천하다 보면 "나비효과"와 같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사회 또한 발전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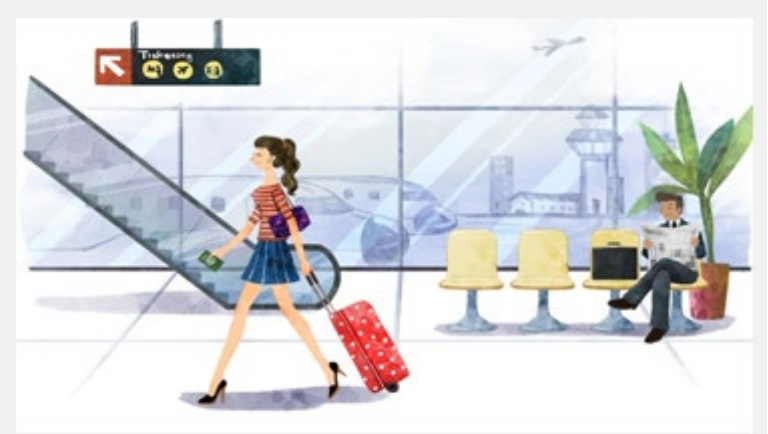


더불어 아이들만 문화를 알고 지역을 교류하는 것이 아닌, 어른들이 몸소 실천하고 배우게 해줌으로써 이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선, 선거의 방법부터 지역감정이 아닌 올바르고 정직한 정치인을 뽑아 선진국으로의 성장을 도와야만 합니다.

지역 간 소통은 현재 한국사회의 발전과 정치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판도의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며 믿어준다면 이 국가적 당면과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내서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참조 - http://www.youtube.com/watch?v=cKtm892b6W8
http://www.youtube.com/watch?v=XGIWMknDtw4

⑧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과)



서구화 된 우리의 생활양식

높게 치솟은 마천루 빌딩 숲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오늘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서울, 인천, 부산 등의 도시뿐만 아니라 변두리 지역에 가도 아파트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외국인들처럼 관광지에 가야 합니다. 민속박물관, 고궁, 한옥마을 이러한 곳에 가야만 전통의상, 전통혼례, 전통풍습 등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의복의 경우 서양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혼례를 포함한 생활양식도 서양의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우리 전통 명절보다는 서구의 명절을 챙기고 더욱 관심이 많으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또한 2~30대의 문화에서 우리 전통적인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주민들은 그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의복이나 생활패턴의 변화는 다소 있지만 긴 세월을 견뎌온 건물만큼이나 사람들의 생활은 오랜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지역축제를 보기 위해 수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들고 있으며,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관광객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이며 주민들은 지역 특산물을 제조하는 독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서구 작가들이 작성한 소설, 고전, 각종 문학작품을 너도나도 구입하여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고전은 상대적으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개인에게 개성이 있듯이 국가와 민족별로 문화가 다르다.

산업화를 겪으면서 서구의 각종 문명이 유입되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씩 차근차근 들여 온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많은 양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오늘 날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처럼 우리 국민들은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것이 좋아 보이고 남이 하면 아무런 여과를 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 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남이 하니까, 좋아 보여서, 별다른 이유가 없이 맹목적으로 유행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 영양은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덩달아 다른 영양들까지 뛰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다른 영양이 뛰니까 한 무리의 영양 전체가 모두 전속력으로 뛰게 됩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벼랑이나 강가 근처에 가게 될 경우 앞선 영양이 위험을 감지하고 멈추려고 해도 뒤에 오던 영양들이 밀어닥치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결국 한 번에 수 십, 수 백 마리의 영양이 죽게 됩니다.

무작정 타인을 따라 하는 일명, '따라쟁이'의 최후는 바람직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도 모른 채 앞으로 달려가는 스프링 영양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란 하나의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는 총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인들조차 한류에 열광하고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케이팝이 전세계를 뒤흔들고 비빔밥과 한국의 전통요리가 전세계로 전파되어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것을 익히고 배워서 각 국민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 문화 등등이 올바르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를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를 바로 세울 때 타문화와 진정한 교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진정한 온고지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역사,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룩한 모든 것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역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 언어를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게 하는 역사교육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나 온 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잘못되고 왜곡된 역사를 진실로 믿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과 분열을 겪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과 역사관이 만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온 국민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길 바랍니다. 그 출발점은 역사를 비롯한 우리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온고지신으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타문화를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 어떠한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온고지신을 바탕으로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⑨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지역주의는 애향심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자제가 나온 것은 아니다

지역주의는 문화적 일체감을 공유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만 놓고 볼 때는 지역주의가 애향심정도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지역주의는 자신의 지역에 대한 호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배타성과 거리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타성과 거리감이 굉장히 심하여 이로 인해 극심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여러 갈래로 국가가 분열되어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지역감정을 완화하고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24일에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에는 총 여섯 분의 토론자가 참가하셨는데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 제87차 월례토론회

배점모 호원대학교 교수는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경제적 소통과 균형적인 발전정책, 정치적 등용에서의 균형,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이용 금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은 선거 후에 일어나는 승자독식 문화의 개선과 국민의 정치적 문해력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이홍종 부경대학교 교수는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것과 도를 없애고 도에서 하는 일을 기초단체인 시나 군에서 하도록 바꾸는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김재근

대전일보 논설위원은 이성적 가치중립적 투표,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미디어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창우 강원일보 부국장은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문화적 소통의 선진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현수 경인일보 편집국장은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섯 분의 토론을 보고 저는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이용 금지와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미디어의 노력에 대해 크게 공감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역감정이 점점 더 완화되고 있는 것이 매 선거 때마다 눈에 보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김경수 후보가 경남지사 선거에서 36.6%,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 선거에서 40.3%, 부산시장 선거에서 오거돈 무소속 후보가 49.34%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월례토론회 이후에 치뤄진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는 전라남도 순천, 곡성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전라도에서, 민주당이 경상도에서 한 자리 수 득표율을 기록하던 과거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진보진영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되고 보수진영에서 광주시장에 당선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모두가 이 변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감정으로 당선되던 정치인들과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이득을 챙기던 미디어들이 그렇습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충격발언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정현 후보가 순천에 예산폭탄을 준다는데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갑원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찬성할 것입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인물대결이 아닌 지역감정으로 자기 당의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는 후진적인 행위를 우리 나라 제 2당의 원내대표가 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문보다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일이 잦습니다. 이 미디어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거짓말과 선동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악의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성하는 후보는 강제로 사퇴시키는 법안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선거가 정책, 인물대결이 되어야지 지역으로 인해 당락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미디어가 지역감정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지역과 관련된 거짓말과 선동을 하는 미디어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처벌하여 이러한 일을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들이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역감정 극복에 기여한 미디어들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이러한 경제성장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후진국에서나 나타날 정치의 행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치가 바뀌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정치인들과 미디어가 지역감정을 조성하고 부추기는 행위를 못하도록 막는다면 머지않아 지역감정은 사라지고 우리 나라의 정치가 선진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서 정치의 선진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림 3 출처 : JTBC 뉴스 캡쳐

⑩ 이희진(선린대학교 간호학과)



7월 월례토론회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정치갈등의 산물인 지역주의는 끊임없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민중의 의식 속에 부정적인 지역감정이 정착되어 국민통합을 막고 있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선진화포럼은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은 "정치갈등을 줄이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정치적으로 동원되기 이전에 지역주의를 문화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며 지역이기주의 극복과 해결책으로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적 소통으로 '어떻게' 민중이 통합되고 지역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경상도에서 자란 저는 안타깝게도 자라오면서 타 지역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습니다. 특히나 경상도와 상극이라 불리는 전라도 지역 근처에는 가 보지도 못했는데요.

이렇듯 다음 세대를 이끌 청소년은 문화적 소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주어지는 여건이 아니고서야 지역갈등을 해소 할 여지조차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지역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갈등 해소가 목적이 아닌 '지역화합'이 목적이 되는 교육적인 활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환학생제도가 유행인 요즈음, 타 지역 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간 학생들간의 교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 입니다.

또한, 각 지역의 유적지를 견학하며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는 것이 아닌 낯선 지역으로 학생들이 선정해서 가는 것도 타 지역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경쟁력이 있고 특색 있는 교육체제와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사들의 열린 사고방식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은연중에 지역감정이 묻어나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들이 먼저 찾아가는 문화적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사나 프로그램의 컨텐츠가 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축제는 어른들의 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색을 살리되 젊은 층이 어우러져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면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컨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러 지역을 막론하고 콘서트에 참여하는 10대 팬들만 보아도, 그 흥미를 자극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SNS 를 통해서 순식간에 정보가 확산될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만들어진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은 다시 정치적 요소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시민들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 시작은 문화적 소통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프로그램은 도(道)의 격차와 지역갈등을 완화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⑪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어떤 사람에 대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좋게 본 적 있나요. 지역감정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게 가지는 좋지 않은 생각이나 편견'으로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건전한 지역감정은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으로 지역의 문화, 경제 발전의 이바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묵은 지역감정이 기승을 부리고, 양극화와 이념갈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사회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영호남 지방의 갈등은 1971년 대선 과정에서 박정희, 김대중이 출신지역의 지지를 동원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비롯되어, '따라잡기'형 경제개발 시기 이후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생명력이 긴

사회갈등 유형입니다.



내일로 여행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필자는 해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할 의미 있는 방안으로서 내일로(Rail 路) 여행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일로 티켓은 처음 판매된 시기가 2007년 여름으로 벌써 8년째를 맞으며, 매년 2배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몇 년 전 친구들과 전국을 돌았던 기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입니다. 충북 제천, 강원 영월, 영남 부산, 전남 보성, 전남 광주 등을 다니면서 비록 일주일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때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전국을 한 바퀴 돌고 오니 특정 지역 사람들은 어떻다더라 하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는 편견임을 실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이 고향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거의 지냈기 때문에 표준어가 익숙하고 정말 지역감정이 있기는 한 것인지, 왜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다녀온 뒤로 더욱 영문을 모르게 된 것이죠. 직접 발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새겨진 타 지역들의 이미지로 그 고장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통한 이해 외에도, 내일로 여행은 만 25세 이하 젊은이들에게 여행이 가진 낭만과 여유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배낭여행' 하면 해외여행만을 떠올리던 사람들이 국내배낭여행을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지역별 맛집, 여행지, 숙박지를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을 주고 있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전래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은 젊은 세대가 끝낼 수 있다.

사실 지역갈등은 세계 곳곳에 있는 현상으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산적인 지역감정이 아닌 근거 없이 서로 미워하는 전래의 인습은 분명히 고쳐야 할 대상에 다름 아닙니다. 타 지역에 대한 공격적 태도는 사회통합의 암 적인 것으로, 시민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천박한 언론의 부채질에 휘둘리기도 쉽습니다. 고질적인 지역감정은 어른 세대의 시대 퇴행적인 유물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래의 지역감정을 타파할 주체로서 젊은 세대가 실천해야 합니다. 20~30대는 실제로 지역감정도 거의 없고, 가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으며 선동하는 무리는 싹을 잘라야 하겠죠.

젊은 날의 기차여행은 어른이 되어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입니다. 여행지에 대한 소중한 이미지는 나중에 휴가를 떠날 때 해외가 아닌 산 좋고 물 좋은 국내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외부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전국의 관광지나 지자체로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 지역감정 해소와 아울러 가시적인 성장이 동반되길 기대해 봅니다.

⑫ 정복윤(고려대학교 정경학과)



재해석되는 한국전통음악, 외국으로 진출하다!

얼마 전에 한 뉴스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악이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 활발하게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그 음악에 맞춰 외국인들은 환하게

웃으며 몸을 흔들기도 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은 정치/경제적으로 상호경쟁적인 국가들이지만 '문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경쟁을 잠시 내려두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대결점을 가진 이런 동북아시아 3국가의 모습 속에서 '지역갈등'이 존재하는 국내지역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문화적 교류'의 모습을 통해 한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지역갈등'의 해결점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87차 월례토론회, 지역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하는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제 87차 월례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월례토론회에서는 지역갈등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주성 발제자(한국교원대학교 총장)는 지역주의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지역소통의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점모 토론자(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균형 잡힌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간의 교류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우천식 토론자(KDI 선임연구위원)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필요하며 경제 및 문화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선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홍종 토론자(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지역 간 소통을 위한 인물, 제도, 문화의 변화에 공감하였으며 특히 정치적, 행정적 '제도'의 변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재근 토론자(대전일보 논설위원)는 충청도의 정치중립적인 태도에서, 김창우 토론자(강원일보 부국장)는 지역축제 활성화에서 지역소통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주었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지역갈등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90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역갈등이 이제는 세대가 바뀌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는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젊은 세대로 지역 갈등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점차 완화되고 있는 지역갈등이 문화축제교류를 통해 더욱 빠르게 지역 간 갈등의 벽을 허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문화'에 공감할 수 있었듯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공유한다면 타지역 사람들도 지역의 틀에서 벗어나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문화축제가 단순한 '지역문화축제'가 아닌 세 박자를 골고루 갖출 수 있는 축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문화축제의 '문화컨텐츠' 선정이 좋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것이나 흥미를 끌 수 있는 '문화컨텐츠'여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명물을 소개하는 지역문화축제에 대해 타지역 사람들은 무관심하며 새로운 모험을 하려기보다는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문화를 체험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람들이 먼 길을 와도 아쉽지 않을 만큼 '문화컨텐츠' 자체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지역의 소통을 위해 지역문화축제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역축제방문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문화축제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문화축제의 '홍보'가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소개할 문화가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지역축제'를 검색어에 치면 다양한 지역문화축제를 알 수 있지만 검색 이전에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SNS를 통해 지역문화축제의 활발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 를 통해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꾸준한 홍보가 요구됩니다. SNS 에서는 정보를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역문화축제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문화축제가 단순히 '즐기다'가는 문화축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소통의 해결점이 될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가 단순히 즐기는 것이라면 이는 '재미'와 '화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에서 한 마리는 놓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기획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주민 간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쌓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축제에 갔다 온 후 '축제가 재밌었다' 보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적 교류를 통해 지역 간 화합의 기반을 마련하자!

이렇게 '문화컨텐츠'를 잘 선정하고 타지역 문화축제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축제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문화축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문화축제와 같은 문화교류는 지역 간 경제적, 정치적 화합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국내 주요 갈등이었던 지역갈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지역갈등을 직접 겪은 세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지역소통의

선진화에 대한 밝은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1) http://www.youtube.com/watch?v=-JFm8IOPhvM

⑬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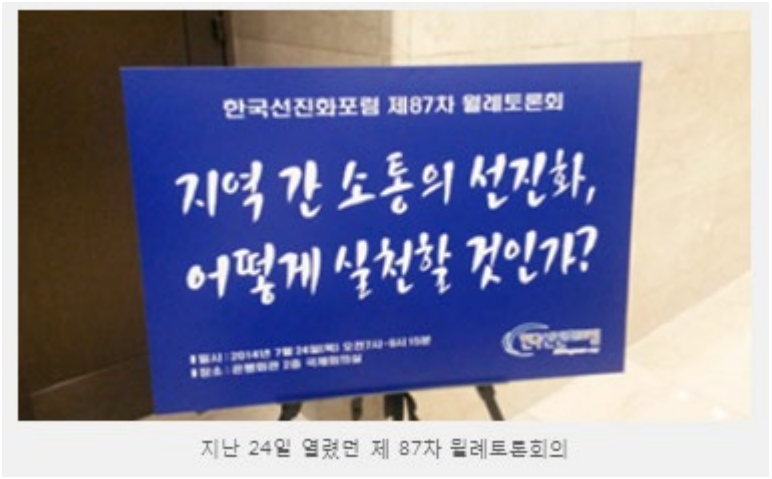


여러분, 가수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 한창 유행했던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수 밤바다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도 그 당시 그 노래에 이끌려 여수 엑스포를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수여행을 계기 삼아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의 오랜 고질병인 지역감정이 다소 완화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에 이끌려 왔던 젊은 남녀 커플부터 시작해 경상도에서 학교 과제를 위해 여행 온 대학생들,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여수라는 지역에 모여 소통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선거철이면 TV 에서 선거 후보와 후보의 공약이 아닌 지역색과 당파색으로 선거의 당락을 점치는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간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반대로 정치와 사회문화적,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아요.

이에 지난 24일 제 87차 월례토론회에서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지역감정에 대한 대화가 이뤄졌다기에 참석해보았습니다.



지난 24일 열렸던 제 87차 월례토론회의

김주성 주제발표자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 문화적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시민공론장을 성숙시켜 지역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배점모 토론자께서는 경제적 소통의 필요성과 동서 교통축의 확대 및 균형적인 발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정치적 등용의 균형과 지역 간 주민들이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 불신과 오해를 제거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셨습니다.

더불어 우천식 발표자께서는 지역주의에 따른 지역 간 갈등과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선도사업(National Flagship Project)의 개념을 도입한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정의 완화를 제시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채택, 정치·사회적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미디어의 노력에 대한 요구, 소통의 선진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같은 바람직한 해결방안들이 아울러 제시되었습니다.


지역 간 소통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교통편의 확대'

대학생들에게 있어 지역감정이라는 개념은 많이 옅어진 듯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지역축제와 해외여행 대신 다녔던 국내여행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한 '내일로'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추세를 더욱 강화시켰지요.

축제의 활성화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홍보와 함께 지역민의 참여가 이뤄지는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만의 특성을 강화한 축제들에 참여하기 위한 교통편의가 잘 구축돼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텐데요.

한편 최근 코레일이 KTX 와 무궁화호 등 요금인상에 나서면서 정기권을 제외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물론 교통의 선진화와 안전에 요금인상은 필요하지만 지리 교통적인 요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는 더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대학 대신 분야를 특화한 대학교 체제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는 종합대학의 형태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큰데요. 각 지역마다 각 특화된 전공을 내세운다면 서울쏠림현상 완화와 동시에 연구중심의 대학육성이 가능해지고, 지역 간의 소통도 역시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역갈등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추세를 몰아 각 지역 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방안이 중요합니다. 앞서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문화적 국가산업과 미디어의 역할이 그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대학생들의 지역탐방과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제 2의, 제 3의 여수 밤바다가 생겨나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4NCnhPZB9us
http://www.youtube.com/watch?v=xvV55qg4_6w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9월 16일 서울대학교에서 제 1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박성찬(서울대재료공 3) :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감정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먼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지역감정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감정은 지역정서, 지역 색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 관심을 뜻하는 개념과 달리 지역감정은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의 삐뚤어진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감정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전라도, 경상도, 충청 각 지역에서 어릴 적부터 살아온 학생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먼저 각 지역별로 현 20 대가 느끼기에 지역감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는 미약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단순히 각 지역의 현실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그 현실 상황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서(서울대재료공 2) : 저는 지역감정이 어른세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또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 저희 세대에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어느 지역 사람 같니?'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전라도 출신이었던 상대방에게 대답하기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인지 이유를 물었는데 그 이유가 다소 놀라웠습니다. 경상도사람들에게는 전라도 출신 같다는 말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실례되는 말이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라도 광양출신으로 사뭇 놀라움과 동시에 일종의 모욕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재건(서울대재료공 3) :저는 경상도 창원 출신입니다. 실제로 경상도에는 전라도를 언급하며 상대방을 놀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가 절대 전라도를 비하해서가 아니라 연대와 고대가 서로를 언급하며 장난스럽게 하는 그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경상도에는 아직은 지역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께서 가끔 결혼이야기를 꺼낼 때 전라도 애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안돼! 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은연 중에, 무의식 중에 아직은 지역감정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서울대재료공 2) : 저는 경북 대구 출신입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저희 세대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같이 지낼 때도, 서울로 학교를 와서 다양한 지역과 어울릴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거철에 지역 색이 짙어지곤 합니다. 특정지역은 특정 당이라는 것이 강하게 드러나고 또한 지역 신문에서도 은근슬쩍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도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평소에는 옅게 나타나던 지역감정이 선거철에는 두드러지고 그 영향력이 잠시만이지만 엄청나다는 사실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감정은 일상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아직은 정치적인 측면의 지역감정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찬(서울대재료공 3) : 저는 경기 군포 지역 출신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사실 특정 지역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각 지역의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하고 유동인구가 대부분이라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른세대와 저희 20 대에도 없던 지역감정이 청소년들에게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인터넷 매체를 접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감정을 희화화하여 표현하는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그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자연스레 그런 의식이 어릴 적부터 배양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형균(서울대재료공 3) : 저는 충청도 대전 출신입니다. 우선 충청도의 지역적인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도는 국토의 정중앙,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모든 지역과의 교류가 원활합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에서 이사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지역감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지역감정이 보이지 않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저희 지역만의 감정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대전이 남들보다 살기 좋은 도시라는 우월감입니다.

많은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정이긴 하지만 대전은 유독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을 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일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곳곳에서 발견되는 지역감정

박성찬(서울대재료공 3) : 충청, 전라도, 경상도 각 지역에 거주하는 20 대 계층에서 지역감정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각 지역에서 지역감정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하는 지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은 전 세대와 다르게 지역감정이 두드러지지 않다는 희망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지역감정 사례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의 수준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청소년계층에서 다시금 지역감정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선거철이 되면 지역감정이 다시금 수면 위에 드러나고 아직까지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계층에서 단절되는 듯 보였던 지역감정의 불씨가 일어나는 것과 선거철 지역감정이 불거지는 지역감정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서울대재료공 2) : 기존의 정치인들의 정치 형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속된 말로 자신의 '텃밭'인 지역에 대해 몰아주기식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을 뽑아준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유착되어 당연시 된다면 정책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선거가 자칫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지역이 아닌 나라를 위한 이성적인 형태의 정치적 태도를 보여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선거철 공약을 중심으로 경쟁해야 하는 이들이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표를 쉽게 얻으려 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관행은 지역감정을 대를 거듭해서 부추길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와 고민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그들의 역할을 망각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그런 식의 방식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그런 잘못을 하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 경계의 역할을 해주고 이를 언론이 뒷받침해주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지역감정을 더 이상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경풍(서울대재료공 3) :저 역시도 정치인들의 편향적인 정치 태도, 그릇된 선거 경쟁 방식이 이런 지역감정을 뿌리 깊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저는 막연히 그들에게만 바라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감정이 사라지려면 한 세대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대책보다는 아랫세대로부터의 변화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받아온 선거나 정치에 대한 교육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 개념만을 암기했을 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만의 정치관을 가질 만큼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부족합니다. 실제로 선거철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각 후보의 공약 역시도 관심이 없어 알아보지 않고 당을 보고 뽑는 대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공약 중심이 된다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저는 어릴 적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교육이 이뤄진다면 정치와 지역 간의 연결이 단절되어 자연스레 지역감정의 퇴색으로 연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재건(서울대재료공 3) :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구체화시키면 어릴 때 왜 선거를 해야 하는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스스로 깨닫게 하여 자연스럽게 그게 성인이 됐을 때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 예로 학급반장 선거를 들 수 있습니다. 학급반장 선거, 회장 선거 역시도 대선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간접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 선거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희는 선거를 할 때 1,2,3 번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어릴 적부터 번호만 기억났지 그들의 공약이 기억나는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번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그 후보를 뽑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여 후보에 대한 검증이 어릴 적부터 당연시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찬(서울대재료공 3) :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실제로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선거 기계를 가져와서 간접적인 선거 경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때의 기억이 선거를 할 때마다 떠올라 도움이 많이 되곤 합니다.

저는 윗분들이 말씀 하신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는 정책 싸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고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회적 이익을 창출해내는 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핵심요소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것은 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라고 생각합니다. 2012 년도 지역별 의원의 평균 공약 이행률을 보면 대부분 지역이 40%대를 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실행률은 막말로 정책을 막 내놓는다는 말까지 나오게끔 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 달성에 대한 의무나 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시로는 페이고(pay as you go:재원 확보 방안 마련)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포퓰리즘성이 강한 정책을 제시했을 때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예산이 부족해 실행이 못 되는 경우가 많은데 페이고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한서(서울대재료공 2) : 저는 청소년층의 교육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따르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대중매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에서의 교육보다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방법이 더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사가 참여한 선거 캠페인이나 예전에 책 읽기 붐을 일으켰던 느낌표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장이 뛴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급차가 지나갈 때 길을 비켜주는 일명 '모세의 기적'이 대중들의 인식에 자리 잡힌 사례를 보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단순히 청소년 계층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유권자인 다양한 계층 역시도 적합한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선거층인 노인이나 다소 관심이 적은 부녀자들에게도 해당 계층에 맞는 적합한 선거 교육을 제공한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박성찬(서울대재료공 3) : 지금까지 청소년계층에서 다시금 불거지는 지역감정, 아직까지도 선거철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지역감정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각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정책이 아니라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형태의 선거유세를 벌이거나 지역 몰아주기를 하는 정치인들의 관행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감시자 역할을 하거나 페이고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때부터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유권자가 되었을 때 선거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학급선거를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하거나 대중매체에 영향을 크게 받는 세대인 만큼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도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소통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막는 지역감정의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감정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것에는 매번 선거 때 정치적으로 사용되어 그 감정을 심화시키고 청소년 기에 선거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부재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지역감정을 해소시키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소통의 선진화의 장애물인 지역감정, 이를 잠식시킴으로써 앞으로 지역의 구별 없이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소통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의실에서 학우들과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를 논의했다.

임현수 (서울국문 4): 지금부터 제 1 차 서울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7 월 24 일에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던 월례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각 지역의 젊은 층, 즉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월례토론회에서 다루어졌던 지역감정의 문제와 지역 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나왔던 대안들을 간략히 되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모두 "빨리빨리" 서둘러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지만, 경제적 성과와 별개로 국민들의 심성과 사회 곳곳에는 선진국들에 비해 어설픔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호남과 영남으로 대변되는 지역 갈등입니다. 소통 부재의 원인으로는 편파적인 개발정책에 따른 경제적 격차, 언론의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의 토론 주제를 '각 지역의 젊은 층, 즉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와 같이 좁힌 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서 청소년 및 젊은 사람들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층, 특히 청소년들은 사고가 유연하고 때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지역주의를 주입시키면 똑같은 한계를 가진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미래의 선진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그들이 상생하는 정신을 배양하게끔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세월이 누적되어 고착화된 기성세대의 지역감정을 바꾸기 불가능하다면, 해묵은 지역주의를 타파할 주역으로서 젊은 층이 먼저 개선해나가는 태도를 갖추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감정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로(Rail 路) 여행은 해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다양한 지역을 다니며 그때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입니다.

그렇게 전국을 한 바퀴 돌고 오니 특정 지역 사람들이 어떻다더라 하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는

편견임을 실감했습니다. 직접 발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새겨진 타 지역들의 이미지로 그 고장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느꼈지요.

박인우 (서울지환 3): 저는 일단 균형 있는 등용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요직 인선을 두고 지역편중 논란이 꾸준히 거셉니다.

복지공약에 이어 '대탕평 인사' 약속마저 무시된 것이지요.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이어 최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까지 4 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인사로 채워지면서 사상 초유의 영남지역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능력보다 각종 비리와 '말 잘 듣는'인맥의 낙하산 등용이 만연해 있다면, 장차 새롭게 국가의 공익을 책임져야 할 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조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들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현수 (서울국문 4): 특정 지역에 치우친 인사는 국가적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젊은 세대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주영 (서울성악 2):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힘이 쏠리면 전횡과 부패 등 비리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따라서 권력기관 상호 간에는 건전한 긴장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성의 질서가 엉망이면 그 뒷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김주영 (홍익화공 2): 저는 월례토론회의 김주성 토론자의 발제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이 보여주듯이, 개인주의적 정체성이 강화되어 '차이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중요하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입장도 '나'와 같은 하나의 개인으로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의의 극복은 바로 여기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며, SNS 로 대변되는 개인주의 문화의 주역은 다름아닌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집단적인 정체성이 발전하였습니다. 개별적인 행동양식보다는 지역사회의 지배적인 행동양식에 순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요.

윤득공 (동국물리 4): 이와 관련하여 '건강한' 지역감정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개인주의라는 것이 얼핏 들으면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과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열심히 노력을 경주하게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시장경제에서 각자의 건강한 경쟁이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수 (서울국문 4): 앞서 언급된 바 있지만, 개인주의의 확산과 사회의 다원화는 차별의식이 아닌 '차이의식'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차별의식은 타 지역에 대한 배타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게 하지만, 차이의식은 타 지역에 대해서 관용적인 평등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다원화 사회의 중심으로서 젊은 세대가 지역 간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용준 (경기경영 4): 저는 지역감정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접 몸으로 다양한 지역을 경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머리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면 어떤 볼거리가 있고 어디가 좋은지 체험해 보아야만, 하나의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로 여행은 청년들이 지역감정의 벽을 부담 없이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박인우 (서울지환 3): 뿐만 아니라 젊은 날 여행지의 기억은 나중에 휴가를 떠날 때 해외가 아니라 산 좋고 물 좋은 국내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외부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전국의 관광지나 지자체로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 지역감정 해소와 아울러 경제적 성장이 동반되길 기대해 봅니다.

김재겸 (서울경영 2):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국내로 떠나는 것이지요. 관심을 갖는다면 놀러 가기 좋은 명소가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해외나 제주도만 생각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색을 이야기해주는 교육이 일상화되어 청소년들이 열린 마음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김주영 (서울성악 2): 이 방법을 시행할 중심은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소모적인 지역감정을 방지하고 국민통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일은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는 공익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김재겸 (서울경영 2): 현재 우리는 잠재성장률 감소 및 성장 동력의 부재에 직면하여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형국에서 전래의 지역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국가경쟁력은 고사하고 국민통합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바로 서려면 한국사회에 만연해 온 지역감정을 근본부터 손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절실합니다.

김주영 (홍익화공 2): 지역감정의 삼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각 지자체와 타 권역의 학교가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지를 물색하고, 학생들이 지역특색의 문화를 체험하게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청소년층의 지역감정 극복이라는 과제를 짊어진 정부의 물심양면의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요.

김재겸 (서울경영 2):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은 다릅니다. 민간부문은 자유로운 경쟁 구도에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반면, 공공부문은 사회의 융합을 주도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화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개별 지역들을 융합하여 통합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균형 있는 등용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수 (서울국문 4): 청년들이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길은 직접 타지를 다니는 경험을 통해 가능하며, 초,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국내 각지로 떠나는 방법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사회갈등 해결의 시작으로 지역 감정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한다는 정부 각료들의 의지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젊은 층과 청소년들이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우선 출신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편중된 고위인사의 문제가 후대에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탕평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이 보여주듯이 개인주의적 정체성이 강화되어 '차별의식'이 '차이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 주역이 바로 젊은이 및 청소년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떠나는 내일로 여행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국내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공부문을 주도하여 지역 간 융합을 통해 경제적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대학생들끼리 지역 소통의 선진화를 고민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1 차 서울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고려대학교에서 제 1차 선진화연구모임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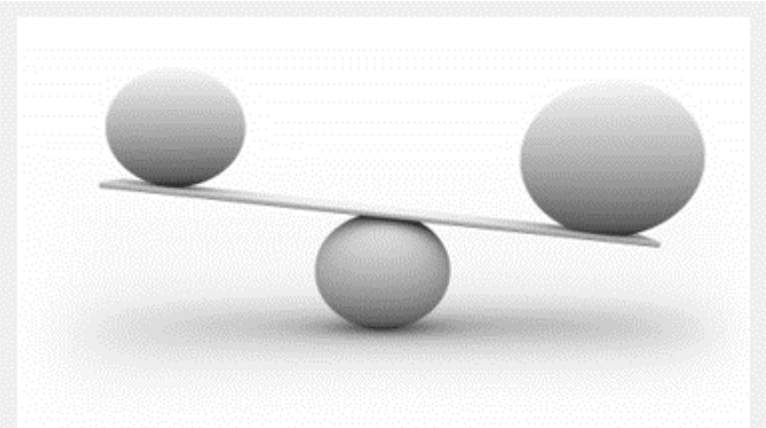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주의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 월 24 일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토론회의 내용 중 일부를 뽑아서 대학생 버전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상태에 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조선희(고려대 식자경 2) : 지역의 위치, 지형적 요건 등을 고려할 때 호남지역은 지형상 농업이 더 적합한 구조이지, 공업이 발달할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영남 지역은 바다가 깊어 항구를 짓기에 적합해서 원료를 들여오고 제품을 수출하는 데에 적합하여 무역 쪽으로 발달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영남지역이 호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차이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발생했다는 건 맞지만 환경적 조건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공업에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는 낮은 임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저가격 정책이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의 희생이 있어서 60, 70 년대 고성장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성균(고려대 식자경 2) : 저는 경제적 불균형을 가지고 지역 갈등을 조성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호남은 농업 중심, 영남은 공업 중심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옛날보다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호남에 가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 갈등을 조성합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1) : 지역 불균형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행정수도 세종시의 경우 엄청난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잘살자 보다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상태가 심각하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이제 경제적 불균형 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문화적 불균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문화생활을 잘 누릴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서는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임성균(고려대 식자경 2) : 문화는 복지적인 측면인데,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제공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희(고려대 식자경 2) : 복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문화산업은 대부분 사기업이 주체입니다. 이윤이 안 되면 기업은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간 문화적 불균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문화회관 같은걸 중심지에 만들어 놓고,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그곳에서 지역주민들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성균(고려대 식자경 2) : 실제로 보면 경기도 외곽까지만 가도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평택에서도 이런 공연을 보기 어려웠는데 지방에서는 문화를 접하기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다음으로 두 번째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 탈피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생각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단기적으로 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걸 도입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양당제인 지금도 혼란스러운 정치가 여러 당이 난립하게 된다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선거제도만 바꾸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의 갈등이 계속 될 것입니다.

임성균(고려대 식자경 2) :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해서 얻을 장점에 비해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자가 뽑히는 등의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보가 난립해서 자질 미달의 사람이 선발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조선희(고려대 식자경 2) : 사람들의 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선거구제라는 제도만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지역주의 탈피에 도움이 과연 될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1,2,3,4,5,6 후보가 있을 때 1,2,3 후보는 호남권 후보고, 4,5,6 후보는 영남권 후보라면 지역 시민들은 최대한 자기 지역의 사람을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과연 그 선거구 안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뽑힐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1) ;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생각보다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할 때 정치적 비전을 보기보다는 출신 지역, 출신 고교를 보고 뽑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택(고려대 식자경 2) : 선거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누리, 새정치 모두 당차원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덕분에 지역성이 계속 없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사례를 보면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사는 친구의 사례를 보면, 자신이 좌파 진영에 투표를 계속 해 보았자 절대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득표율이 높아지고 있고 언젠가는 새누리당이 아닌 당도 대구에서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의식을 바꾸는 현재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수(고려대 식자경 1) :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면서 시행하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당이 생겨서 다른 의견들을 공유하고 하는 활동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한 명 정도씩만 뽑히니까 정치적 다양성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성균(고려대 식자경 2) : 저는 과연 사람들이 지역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0-80 년도만 해도 삼성이 광주에 와서 해태를 이겼으면, 전라도 사람들이 삼성 버스를 태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구요. 그때는 지역감정이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지역감정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도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지역차별적인 이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인들이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준수(고려대 식자경 1) : 저도 또한 사라져가는 지역감정을 인터넷이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의 유머와 일간베스트같은 사이트에서 서로 지역을 비하하고 싸우는데 여기의 유저들이 이 사이트 외에서도 싸움을 벌이면서 인터넷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성균(고려대 식자경 2) :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수십, 수백만으로 소수가 아닙니다. 인터넷의 영향이 어떠한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 표현을 하자면 초등학생들이 홍어 홍어거리고 다니고, 재미있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커서까지 발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수(고려대 식자경 1) :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도 활동하는데, 소수나 다수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성균(고려대 식자경 2) : 박근혜 정부가 대통합을 목표로 출범했는데, 지금만큼 대통합이 중요한 시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론이 통합이 되고 같이 함께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지역감정이 통합에 발목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재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커서는 인식이 고정이 되어 쉽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지역감정의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유 없이 재미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지역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인 '지역축제가 지역주의 탈피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조선희(고려대 식자경 2) : 지역축제가 실효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제문화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축제는 부여, 공주에서 운영이 됩니다. 부여, 공주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엄청 경쟁을 합니다. 개막식을 부여에서 하면 공주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공주에서는 폐막식을 엄청 크게 벌이면서 부여에 보복합니다. 지역축제가 지역 간 갈등을 극대화시킨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경한 사회자에게 받은 자료에서 평창과 부산을 언급한 것을 봤습니다. 이 두 도시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경쟁을 했습니다. 평창과 부산이 경쟁했지만 평창이 된 이후에는 모두가 평창을 응원하면서 지역주의가 탈피되었기 때문에 지역축제가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지만 이는 외국이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성균(고려대 식자경 2) : 저는 지역별 특성이 친숙해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축제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유명무실한 것이 많아 졌습니다. 그 지역만의 특색을 담은 실질적인 컨텐츠를 개발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만의 특색을 담은 지역축제를 제대로 만든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사라질 것입니다.

박예슬(고려대 식자경 2) : 저는 임성균 토론자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최근에 통영 이순신 장군이 계셨던 곳을 다녀왔습니다. 통영의 이순신 장군 축제는 그 지역 특징도 말해주고 역사도 알려줘서 통영이 이렇게 중요한 도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마다 축제를 비슷한 키워드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만 커질 것입니다.

이준수(고려대 식자경 1) : 지역축제로 지역주의 완화를 하려면 지역축제를 정말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축제을 여는 목적 자체가 지역 주민들이 돈을 벌어 지역 활성화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몰리는 축제들은 이미 학창시절에 배워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다지 큰 효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지금까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상태, 해소 방안은?,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 탈피해 도움이 될 것인가?, 지역축제가 지역주의 탈피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해봤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토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고려대 식자경 2) : 저는 지역갈등의 본질은 우리의 포악한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지역주의의 색을 입고서 세상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는 이러한 공격성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나라 교육이 인성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 인성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시민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이준수(고려대 식자경 1) : 저는 인터넷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사이트에 제재를 가하고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폐쇄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 자유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도를 넘어서는 행동은 그에 응당한 처벌한 받는 것이 옳습니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정치인들이 불을 지피니까 계속 지역주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감정, 지역차별을 조성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할 경우에는 해당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쫓아내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지문(고려대 정통대 2) : 선거기간에 공약집을 나눠주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테스트와 같은 것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묻지마 투표보다는 이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자질미달의 정치인들은 뽑히지 않을 것이고 지역주의도 완화될 것입니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학창시절에 인성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시민으로 양성하는 방안,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사이트들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 지역감정을 조성하는 정치인을 쫓아내는 방안, 유권자들의 공약이해도를 평가하는 방안 등이 오늘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제시됐습니다. 이 의견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왼쪽 앞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정원, 구본웅, 심재인, 정복윤, 이정윤, 강민서, 곽은혁

정복윤(고대 정경 1) :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정경학부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통의 선진화를 위해서 두 가지 소주제를 설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축제의 한계와 극복방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라는 문화적 소통은 국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이므로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원(고대 정경 1) : 저는 울산에서 삽니다. 저는 검색해본 결과 울산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도 제가 모르는 울산축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심지어 지역사람인 제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참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지역문화축제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도 어린아이들에게 치우쳐져 성인들의 흥미를 이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핸드폰 어플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어플을 제시한 손님에게는 할인혜택도 주는 방안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성인들의 흥미를 이끌지 못하는 지역문화축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커플' 테마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커플로 오게 되면 혜택을 줄 수 있고 '커플'이 함께할 수 있는 컨텐츠도 개발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웅(고대 정경 1) : 저는 먼저 주목한 것이 독일의 맥주축제와 같이 자국을 대표할 문화축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적인 컨텐츠가 부족하며 지역문화축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이 시급하며 단기적인 경제적 측면만 집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타지역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져 지역소통의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민서(고대 정경 1) : 너무 지역문화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특색과 관계없이 소규모로 빈번하게 축제를 계획하고 이에 따른 인력/예산 낭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문화특색과 잘 결합한 문화축제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사는 익산에는 미륵사지 석탑의 문화재를 살린 축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막무가내로 생겨나는 축제가 아닌 지역특색을 잘 캡쳐한 지역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정윤(고대 정경 1) : 저는 지역문화축제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문화축제의 컨텐츠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좀더 거시적으로 지역자체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자체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지역에 사람들을 관광 올 수 있도록 유치한 후에 그 지역 내의 지역문화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어플에 대한 인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지역문화축제를 소개해주는 어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1 억이 넘는 카톡다운로드 수와는 대조적으로 이 어플은 다운로드 수가 10 만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역문화축제 컨텐츠가 좋은 어플의 개발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홍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지역문화축제 홍보!

곽은혁(고대 정경 1) : 저도 지역문화축제의 홍보가 잘 되지 않는 한계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문화축제의 홍보측면에서 페이스북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홍보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이 개인의 주소지를 알 수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근처 지역문화축제를 추천해줌으로써 홍보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원스톱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한번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지역문화축제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초기투자가 많이 들긴 하겠지만 지역문화축제의 위치를 고려하여 서 너일 동안의 코스로 많은 축제를 둘러볼 수 있도록 루트를 짜고 교통편을 마련해줄 수 있다면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재인(고대 정경 1) : 저는 사람들이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친숙함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실제로 접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서울같은 인구밀집지역에 지역문화센터를 설립하여 그 안에 지역문화축제의 일부분을 옮기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문화축제의 일부분을 체험하면서 직접 문화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문화를 익히면서 간접적으로라도 타지역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 간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이천 쌀 문화 축제'를 살짝 맛볼 수 있다면?

정복윤(고대 정경 1) : 네 감사합니다. 지역문화축제의 한계와 극복방안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마치고 두 번째 주제, 지역 간 소통을 위해 2030 세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는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지역 간 편견으로부터 때묻지 않은 순수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지역 간에 팽배한 감정을 완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30 세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인(고대 정경 1) : 저는 대학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같은 분야에 관련된 두 대학의 동아리를 연합해서 함께 교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경제동아리끼리 교류하는 것이죠. 대학생들끼리 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 이해와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윤(고대 정경 1) : 저는 영남 호남 지역학생들이 서로의 지역에 가서 농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지역에 관심과 애착이 커지고 그로써 지역 간 오해와 불신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곽은혁(고대 정경 1) : 저는 20 대 남성들이 가는 군대 내에서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군대 내에 흑인과 백인을 같이 배치하여 인종차별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많다고 합니다. 군대 내 한 소대에 다양한 지역 사람들을 함께 배치하여 훈련하며 전우애를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본웅(고대 정경 1) : 저는 기성세대와 다르게 2030 세대에서 지역감정이 생겨난다면 특정 사이트에서 지역갈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이트에서 하나의 소재로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 지역을 비방하고 그 지역은 다시 반박을 하는 형식으로 점차 지역갈등의 양상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그 지역사람들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보려는 젊은세대들의 태도를

버려야 하며, 익명이 전제된 사이트들에서의 발언들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원(고대 정경 1) : 저는 얼마 전 한 지역에서 지역감정에 대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고등학생들도 지역감정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 '소통'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한 방법으로 저는 '토크쇼'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방영된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은 '성'이라는 조심스러운 부분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서 더욱 인기를 끌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지역갈등'이라는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이를 솔직하게 토크쇼로 이끌어낸다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 솔직한 토크쇼 '강심장'의 모습

즉 몇몇 지역에서 연령대별로 사람들을 뽑아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케이블방송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 파급력이 큰 인터넷방송 같은 것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인(고대 정경 1) : 기성세대에게 젊은세대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 특히 노인분들같은 경우는 지역감정이 더 완고하십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학생봉사활동단체에서 도움을 준다면 노인분들의 지역감정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민서(고대 정경 1) : 저는 전라도에서 쭉 살았는데 저는 지역감정에 대해 별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타지역에서 온 친구들을 접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대학교에 올라와서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는 많은 지역사람들의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대학교 내 동아리뿐만 아니라 연합동아리를 활성화해서 다양한 사고를 가진 다양한 지역에서 보인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복윤(고대 정경 1) : 여러분,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논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토의를 통해 지역 소통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축제에 관한 첫 주제를 통해서 지역문화축제 홍보문제와 컨텐츠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소통을 위해 2030 세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대학 내 동아리, 농활이나 군대를 통한 교류, 토크쇼 등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을 달성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이면서도 지역을 구분하려는 지역주의를 이제 버리고 선진국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그림 2) http://www.youtube.com/watch?v=41Y4zlR_sJQ
그림 3) http://www.youtube.com/watch?v=YpzCNEyjwlY
그림 4) http://www.youtube.com/watch?v=_6mVPYNivFE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9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에서 열린 1차 선진화 연구모임

김현성(이화여대 방송 4):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1 차 모임에서는 지역간 소통의 선진화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역 간 소통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오랫동안 나타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지역 간 갈등과 소통의 문제가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지역 간 소통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역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문화적 소통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지역축제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임소현(이화여대 작곡 4): 저는 지역축제라는 것이 사회복지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질 높은 정신적 삶에 대한 추구를,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동질성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가 '우리'라는 통합적 개념보다는 '나'라는 개인적 개념이 강한 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을 확보하려면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축제의 활용이 갈등을 불식시키고 지역 간 소통의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비(이화여대 방송 3):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교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서 직접 보고 접촉하는 것이 타 지역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기회로 축제만큼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역감정보다 더 큰 것이 '반일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 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 축제 한마당에 가게 되었는데 일본의 전통놀이, 축제. 기모노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부스도 있었고 실제로 기모노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반일 반일해도 축제를 통해 노는 것을 좋아하는 건 만국 공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 일본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슬(이화여대 방송 4):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 대부분이 비슷하고 지역적 특색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축제가 외형상으로는 관광특산 31.6%, 문화예술 40.6% 전통역사 15.9% 지역특산 11.9%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종합축제가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행사내용 자체가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신이 나도록 하기보다는 행사를 위한 낮 내기식 행사의 종목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스포츠대회, 춤, 인기가수공연, 불꽃놀이, 특산품 판매, 먹거리장터 운영 등이 빠지지 않고 심지어 개막식 축하공연과 불꽃놀이에 행사비용의 30%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지역 축제가 아직도 상당수 많다고 합니다.

임소현(이화여대 작곡 4): 동의합니다. 지역축제가 지역감정을 완화시키고 지역 간 소통의 최적의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모습은 대부분의 축제가 9-10 월에 집중되어 있고 예산이 많게는 수십 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들 행사의 상당수가 유사하고 너무 빈약한 볼거리로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함희수(이화여대 광홍 4): 저 역시도 의견을 낸다면 축제의 의의가 지역의 문화를 창달하고 지역 간 소통 의식을 높이자였지만 지방자체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마다 생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가 돈벌이가 되는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자기들 지역끼리 똘똘 뭉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는 현실이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성(이화여대 방송 4):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니 현재 지역 축제의 문제점들로 인해 근본적으로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보입니다.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이단비(이화여대 방송 3): 저는 우리나라 지역축제 패러다임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축제에 관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축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축제 관련자와 주민들이 왜 지역 축제가 필요한 지 공동체 의식 축제에 대한 인식을 더 깊고 넓게 가질 수 있도록 만남의 장,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축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지역 문화를 타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며 새로운 공동체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슬(이화여대 방송 4): 저는 아까 지역축제 대부분이 비슷하고 특징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 특산물 등을 특색 있게 차별적으로 만들어 경쟁력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적인 무언가 하나를 대표적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산에서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처럼 각 지역 모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강력한 콘텐츠 말입니다.

임소현(이화여대 작곡 4): 근데 다른 지역에서 아직 시도하지 않은 강력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무기도 중요하지만,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끼는 체험프로그램 중심으로 꾸며 직접 오감으로 느껴보는 것이 그 지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지역 정체성을 느끼는데 친근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로 보령머드축제는 그 어떤 축제보다도 재미와 다양성을 가진 대표적인 체험 잔치 축제입니다. 타 축제들처럼 관광객들이 마냥 볼거리를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닌 축제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자발적

놀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드판타지목포, 대형머드탕, 머드커플 슬라이드, 갯벌극기체험 등 신나는 체험축제 한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희수(이화여대 광홍 4): 저는 지역 간 교류가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는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축제 속에서 지역 간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토론의 자리도 함께 마련되면 더 의미 있는 지역 간 교류의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지역 가치관을 이해하며 질서를 재창조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죠.



이단비(이화여대 방송 3): 저도 한가지 더 의견을 낸다면 축제라는 것이 일회적 행사로 끝나곤 하는데 이를 장기적 교류로 바꾸기 위해서 축제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간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NS 를 통해 소통의 장을 열어 서로 축제를 즐기며 남긴 사진들을 서로 공유하며 서로의 일상을 주고받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 교류로 축제의 본래 취지인 지역 간 화합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성(이화여대 방송 4):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지역축제가 지역감정을 완화하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타지역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지역축제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지역축제가 비슷한 구성으로 타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불러오고 있지 못하는 점이 언급되었으며 축제가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 지역발전으로 이용되어 지역감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 높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 축제가 왜 필요한지 지역 간 소통의 활성화라는 근본적 축제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교육 프로그램마련과 각 지역의 차별화할 수 있는 브랜드 축제 기획, 체험 프로그램 중심의 축제 기획, 축제 속에 마련된 토론 자리, 축제 후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고질적으로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감정이 지역축제를 통해 소멸되는 날이 빨리 오길 희망하며 토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4일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제 1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손민지(이화교육 3) :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역간 소통의 선진화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미리 전달했다시피 지난 7 월 24 일에는 '지역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재)한국선진화포럼 87 차 월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의식 한가운데 남아있는 지역감정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특히 선거를 할 때나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지역에 대한 선호나 혐오에 치우쳐서 결정하는 모습은 시대가 변해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지역감정은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갈등을 줄이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정치적으로 동원되기 이전에 지역주의를 문화적으로 완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지역간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소통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임소리(이화교육 3) : 대표적인 문화적 소통의 방법으로 지역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거의 모든 지역에 존재합니다. 보령머드 축제, 강릉바다 축제, 금강여울 축제, 여수국제청소년 축제, 거제국제연극제 등 전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가 연간 1500 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2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축제산업의 소비지출 규모는 약 3 조 5 천억 원으로 영화산업 전체 매출 규모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에는 지역주민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참가하고, 최근에는 외국인들까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축제를 통해 타 지역주민들이 특정지방의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교감하게 한다면,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현아(이화교육 3) : 하지만 지역축제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상당수의 지역축제가 구성이 유사하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빈약하여 많은 비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좀 더 그 목적이나 주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역화합축제처럼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호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합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역화합축제는 한국에서 지역감정이 가장 강한 영호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1992 년 영호남한마음축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96 년 하동에서 열린 화개장터영호남화합축제마당, 순천만에서 열린 섬진강마라톤대회, 2012 년부터 광양에서 열린 영호남축구선교축제, 2014 년 고성에서 열린 영호남친선자전거축제 등 다양한 지역화합축제들이 열렸습니다.

지역 간 문화적 소통을 위해 지역문화축제도 활성화시켜야 하겠지만, 이처럼 행사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한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지역 간 소통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

정윤아(이화교육 3) : 이현아 학우의 말처럼, 지역문화축제도 좋지만 행사의 성격과 목적이 분명한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축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서울, 파주, 정읍,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로,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시·발표·체험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이처럼 축제의 성격자체가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교육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민지(이화교육 3) : 저도 문화적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문화적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학과나 동아리 초반에 친목을 다지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더 익숙해지고 친밀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운동경기나, 각 지역 농민들이 모여서 장터를 함께 여는 직거래 장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운동경기의 경우 지역 대항으로 하면 지역감정을 더 조장할 수 있으니 랜덤으로 팀을 선발하면 좋을 것입니다. 운동경기 자체가 어떤 결속력이나 화합 등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소통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 농민들이 모여 직거래 장터를 연다면, 지역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음과 더불어 우리 농식물을 알리고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허슬이(이화교육 3) :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취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학우들의 의견은 사실

기성세대를 위한 것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지역에서 하는 축제에 잘 가지 않죠. 오히려 SNS 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SNS 를 통해 지역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기성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들에겐 지역감정이 옅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혹은 일부 네티즌을 통해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는 용어가 확산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지역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감정이 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손민지 학우가 칼럼에 쓰신 드라마 응답하라 1994 가 아닐까 싶습니다.

응답하라 1994 는 지방 출신 학생들의 좌충우돌 상경기로, 각자 다른 사투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큰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라도 순천 출신 '해태'와 경상도 삼천포 출신 '삼천포'가 자신들의 사투리로 욕을 하며 투닥거리는 모습, 여수 출신 '윤진이'와 삼천포의 사랑이야기 등은 해당 지역의 이해를 돕고 친근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지역감정을 허물기 위해 지역감정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 등을 많이 만든다면 젊은 세대들 나아가 기성세대들 안의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단위로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손민지(이화교육 3) :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 제안해 보자면, 저는 '서포터즈'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포터즈나 홍보대사를 활용한다면 허슬이 학우의 말처럼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민간주도하에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업과 학교 등에 서포터즈나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을 뽑아 그 단체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죠.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각 지방, 대학마다 홍보대사를 뽑아, 때론 전국적으로, 때론 다른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대학생들은 SNS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이고, 파급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적 소통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패널의 의견에 질문이 있거나 덧붙이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정윤아(이화교육 3) : 좀 전에 저는 평생학습축제를 제안하면서, 평생학습공동체의 역할을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그에 대해 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최근 평생교육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강조되면서 각 지역마다 학습공동체가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평생학습공동체가 다른 지역들의 평생학습축제에서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면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예컨대 경상북도의 평생학습축제에 파주나 광주 등 다른 지역의 평생학습공동체가 참여해 자신의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놀이나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혹은 그 지역의 평생학습공동체와 연계해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한 캠패인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에서부터 지역 간 교류가 시작 될 수 있고, 각 지역의 평생학습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의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평생학습축제와, 이에 참여하는 평생학습공동체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중앙에만 모였던 주민들의 관심을 지역사회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도 지역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민지(이화교육 3) : 저는 교육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생교육 등의 분야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초·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감정과는 다른 사례이지만, 미국의 경우 워낙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살다 보니 '차별'에 관한 교육을 자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텍스트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차별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지역감정의 문제를 학생들이 피부로 깨닫고, 지역감정을 갖고 내보이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행동인지를 알게끔 교육시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인지적인 영역에서 이해시키고 그것들을 점차적으로 행동의 영역으로까지 확대시켜, 자신이 지역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드러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지역감정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특정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개념 없는 행동인지를 아주 당연하게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당장은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지역감정을 갖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민지(이화교육 3) : 네,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지역 간 소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문화적 소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해 현재 많은 지역 축제가 구성이 유사하고 지역 간 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성격과 주제가 명확한 지역화합축제나 평생학습축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평생학습축제의 경우 성격자체가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교육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 운동경기나 직거래 장터를 여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며, 특히 스포츠의 경우 국민들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매게인 만큼 국가사업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젊은 세대들 사이에 퍼진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성 세대와는 다른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서포터즈를 만들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 지역감정을 해소하자는 의견과, SNS 를 통한 문화적 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드라마나 영화같이 문화적인 컨텐츠를 이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지역감정 자체가 옳지 못한 것으로 당연시 되도록 학교현장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한 문화적 소통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았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었습니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지역감정이 하루 빨리 사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열성적으로 토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지출처
: http://kfprogress.org/client/notice/viw.asp?idx=3453&cpage=1

④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9월 12일 숭실대학교에서 조만식 기념관에서 열린 제 1차 선진화 연구모임

김초아(숭실대 행정 3) : 지금부터 숭실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역 간 갈등문제는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진입 하는데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 간 소통을 통해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연구모임은 지역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 특히 언론과 정치의 올바른 방향에 초점을 맞춰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숭실대 국제법무 4) :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라는 주제에 앞서 먼저 지역감정이 유발된 원인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감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감정 문제는 미국과 같이 남북 간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도 아니고 정치권의 권력 획득,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한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끼리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겼고, 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갈등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의 산물인 것이죠. 아무리 젊은 세대 들어서 지역감정이라는 문제가 많이 옅어졌고, 이에 대한 체감도 또한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 간 갈등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영-호남 간의 갈등은 이념 문제로까지 번지고, 인터넷에서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며 누리꾼들끼리 싸우는 모습 등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지역감정이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남준(숭실대 경영 4) : 동의합니다. 지역 간 갈등은 아시다시피 영남 호남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산업화 시대에 호남이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과정에 있어 소외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인구도 많아지고 이에 따른 부가적인 발전도 하게 되는데 호남은 그렇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간 갈등이 생기고 소통 또한 적어지는 것 같아요.

오병호(숭실대 경제 4) :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요인도 있긴 한데 저는 교통,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가가 영남에 있고 친가가 호남 쪽에 있는데 외가에서 친가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1 차선인 고속도로도 많고 길 자체가 일단 너무 좁을뿐더러 버스도 별로 없어서 교통이 정말 열악합니다.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길이 얼마나 넓어지고 편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로간의 왕래가 어렵다 보니 교류 자체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도 지역 간 소통이 어려운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굳이 안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소통과 교류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

김초아(숭실대 행정 3) : 네,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지역 간의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요인, 정치인들의 태도, 환경적인 요인 등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요인들을 더 심화시키는 것은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다루는 언론과 미디어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특히 온라인에서 문제가 심한 것 같지 않나요? 아무리 온라인에서 조회수와 이에 따른 광고비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언론의 본분인 '정확한 정보전달'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지역감정이라는 문제와 현실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분석하는 것은 좋죠. 하지만 이것이 중립을 잃고 한쪽에만 편향된 내용이라면 오히려 분란만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 좀 강제성 있는 제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남준(숭실대 경영 4) : 일부 언론들이 지역감정을 타파하려는 노력보다도 이를 이용해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어떻게 강제성을 가해야 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충호(숭실대 국제법무 4) : 강제성 있는 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은 좋으나, 사실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의 말은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말이나 보도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이를 대변하면서 나타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강제성이 있는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헌법상으로도 위헌이죠. 분명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상대에게 심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지역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비방하는 것 또한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더 어떻게, 얼마나 강제성을 가해야 할까요?

하지만 거대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소신없는 일부 언론들의 태도에 대해선 분명 비판할 점이 많습니다. 공정한 보도가 아닌 특정 인물이나 지역에 편향적인 보도는 분명 언론이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봅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나 법적으로 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양해나(숭실대 행정 3) : 저도 이충호 학우 의견과 마찬가지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강제성을 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얼마나 실천할지는 그들에게 맡겨야겠죠.

혹여나 강제적 제제가 이뤄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지역감정 문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치인들과 언론의 몫이고, 그들의 자생적인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순천 곡성지역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난 것처럼 점점 유권자들은 '지역'이라는 감정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와 정치적 비전을 볼 것입니다.

또한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거나 너무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친 언론에 대해서는 점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가 중립적으로 올바른 보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도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지역 언론들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언론이라고 해서 너무 자기 지역에 편향된 보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즉,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스스로의 성장, 이에 따른 균형발전이 중요

오병호(숭실대 경제 4) : 다들 영호남 지역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지역들이 지역감정이 가장 심하고 서로간의 소통 또한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와 이에 대한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거대도시인 서울의 파워가 크긴 하지만 이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만큼의 지원과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는 우리나라 전체의 화합이 중요한 것이고,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있는 성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충호(숭실대 국제법무 4) : 맞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여행만 다녀봐도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많고 각종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수에서부터 부대시설들을 보더라도 느낌이 다르죠.

김초아(숭실대 행정 3) :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정리하자면, 지역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지역 간 갈등을 줄여야 하고 우선 지역 간 경제 개발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혹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오병호(숭실대 경제 4) : 지역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호남과 영남 간의 갈등이 심한데, 상대적으로 그 동안 소외받았던 호남의 인구도 늘리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큰 기업들과 산업단지를 옮기는 등 울산이나 창원처럼 지역 성장을 위한 환경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도 좋겠고, 전주 한옥마을 같이 지역 자체의 특성을 많이 살리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가 우선 성장을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이에 따라 산업이나 교통 등도 덩달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남준(숭실대 경영 4) : 학우님께서 지역 자체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에 대해 공감합니다. 지역 간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역감정이잖아요?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어떤 지역은 차별받고 어떤 지역만 지원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지역감정은 더욱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화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갈등 문제는 과거에 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엔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역 간 소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감정을 배제하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영호남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를 아시나요? 이 축제는 지난 1997 년 영호남 화합운동이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되며 시작된 생활체육 축제인데, 광양-하동 간 윤번제로 오가며 축구, 게이트볼, 탁구 등 8 개 종목에 대해 승패와 관계없이 양 시군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지역 간의 우정을 다지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 영호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게 되고, 축제 준비와 진행을 하며 많은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에 따른 편견은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증진될 것입니다.

양해나라(숭실대 행정 3) : 맞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스포츠라는 공통 분모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어 응원하듯이 '문화 교류'라는 것이 지역 간 소통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내일로'같은 제도도 지역 간 소통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초아(숭실대 행정 3) :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연구모임 토론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역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많이 옅어졌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따라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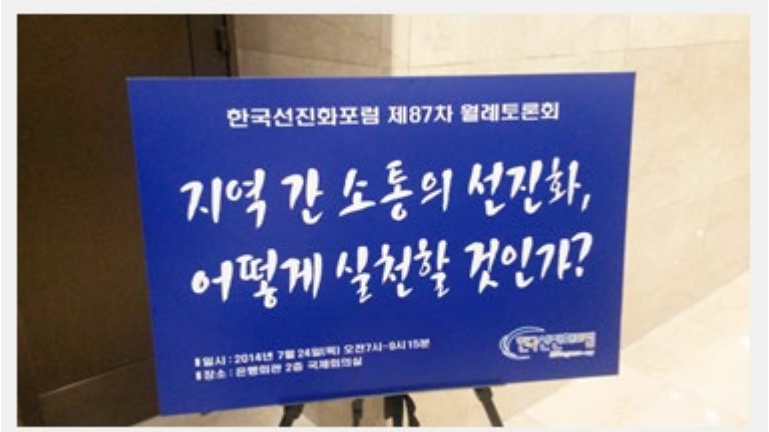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형성된 점,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인해 지역 간 교류가 어렵다는 점, 무책임한 일부 언론의 편파적 보도, 그리고 특히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하며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 등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지역 간 환경적(교통, 산업)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감정'하면 주로 논의가 되었던 영호남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둘째 방안으로는 '영호남 생활체육한마음축제'와 같은 지역 축제 등을 통한 문화적인 방법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축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로와 같은 전국 여행을 통해서도 각 지역을 이해하고 소통하기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지역 간 소통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화합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나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젊은 세대의 몫일 것입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연구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⑤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지난 7월24일 지역감정 해소방안을 찾는 월례 토론회가 있었다

김태준(한양정책 4)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주신 것에 대해 우선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께 사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지난 7 월 24 일에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한 월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1 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감정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지역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의 서로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그 수준이 나아진 것이라 해도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지역감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지역감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기(한양정책 4) 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감정의 해소 방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역감정이란 지역정서 혹은 지역 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역정서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충성, 소속감을 나타내는 반면 지역감정은 지역에 대한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감정은 2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역감정의 원인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은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적 측면은 여전히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성(한양정책 4)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1970 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후보들 간의 선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당시 후보는 영남에서 72%, 호남에서 36%의 표를 얻었고, 김대중 당시 후보는 영남에서 28%, 호남에서 64% 표를 얻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영남의 개발로 인한 영남과 호남과의 경제규모 격차에 따라 지역감정이 나타났습니다. 1995 년 지방 재정자립도 자료를 보면 좀 더 확연하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영남의 지방재정자립도는 44.7%, 충청의 자립도가 37.5%인 것에 비해 호남의 경우 20.5%에 불과했습니다.

김성태(한양정책 3)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지역감정이 과연 그렇게까지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지역감정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인 영역과 결합된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으로 인한 갈등은 외국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의 경우 바스크 지방의 지역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파시즘 시대에는 독립운동까지 일어났으며 아직도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바스크 지방과 마드리드 지방과의 지역갈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 역시 지역감정을 통한 지역갈등이 일어납니다. 대통령 선거나 상원, 하원 선거의 경우 그 특질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서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미국의 동부와 남부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이 외국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심각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정치적인 측면과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이 스페인의 수준까지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성우(한양정책 3)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번 총선에서 광주지역에 걸린 플랜카드의 내용이 무척 충격적이었는데요. '광주에서 새누리당 만큼은 안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정치적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경제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하는 경향은 많이 희석되었습니다만 아직 정치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성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국론이 사분오열하는 시기에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통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단순히 외국과의 비교해서 갈등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과 북한의 사고방식, 체계가 다름을 보여주는 '남남북녀'라는 프로그램

박준우(한양정책 2) 지역감정이 해소되어야 하는 하나의 이유로 저는 통일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반세기 이상 남처럼 지냈던 사람들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영호남과는 차원이 다르게 한국과 북한은 서로 반목하고 교류가 없이 상당기간을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지역감정의 해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감정의 해소모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선 첫째의 필요성입니다. 만약 그러한 모델이 없다면 적절한 지역감정의 해소방안이 없다는 것이고 향후에 발생할 더 큰 사회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지역감정의 해소를 통해 적절한 모델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상황이 지역감정의 해소를 당장 해야 되는 두 번째 필요성입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숙제의 대부분은 내부적인 협동이 이미 전제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 협동이 전제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준(한양정책 4)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가 너무 지역감정의 발생원인과 그 과정에만 국한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내 드린 자료를 보셨던 분이라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셔도 됩니다.

이경기(한양정책 3) 저는 지역축제가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게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 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면 지역감정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한양정책 2) 그런데 이러한 지역축제가 반드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역축제의 일시성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사실 교류는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지역축제가 계기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일시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정기적인 교류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계기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정기적인 교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감정 해소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한 예시로서 자매결연을 제시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남과 호남의 학생들이 서로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지역감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실생활에서 지역감정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서로 간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인데요. 저는 정기적인 교류를 넘어선 상설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인터넷 매체를 제기합니다. 자매결연보다 더 자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는 향후 지역감정을 뿌리뽑을 수 있는 하나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정훈(한양정책 2)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교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SNS 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괴담의 확산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의 설정에 SNS 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인터넷 공간을 통한 지역감정의 해소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익명성이나 다른 여타의 문제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깊게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류를 통한 신뢰를 형성한다는 목표는 절대로 얕은 관계에서 형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아니라 아직은 오프라인을 주도로 한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체 스포츠 레저 활동은 지역감정 해소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레저활동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등 수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는 야외활동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스포츠 활동은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길러줍니다. 어떤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협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과 성취 이후 얻는 결실을 지역감정의 해소에 접목시킨다면 하나의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의 스포츠 레저 활동은 공동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혼자서도 그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지만 주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아리나 소모임을 통해 단체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감정의 해소와 결부해서 영남과 호남사람 간 단체 스포츠 레저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을 지역감정 해소방안으로 제안해봅니다.

김태준(한양정책 4) 지역감정의 해소와 관련해서 앞서 나온 이야기를 간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감정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지역감정의 형성원인으로 정치적, 경제적인 원인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향후 통일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오늘날의 글로벌 경쟁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지역축제를 통한 해결, 자매결연을 통한 해결도 있었고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해결과 단체 스포츠 레저 활동 장려를 통한 해결방안도 알아보았습니다.

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명시적인 위기 외에도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우리의 지역감정이 바로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갈등의 씨앗을 미리 제거해서 우리나라가 향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과제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의견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미지 출처

1. http://www.youtube.com/watch?v=8V_TlLiGf4A
2. http://www.youtube.com/watch?v=5wni31Qsg5k

⑥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이 바라본 시각

류호영(경영 3): 지금부터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의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은혜(경영 2): 저는 먼저 지역주의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주의가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생겨나지만, 그것보다는 타 지역에 대한 배타심에 의해서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기지역에 대한 귀속감과 타지역에 대한 배타적 거리감들이 각각의 지역 사람들을 진영논리에 취하게 만드는 듯 합니다.

윤현수(경영 2):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지역주의는 끊임없이 정치적 갈등의 산물로 이어져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동원된 지역주의가 정치를 넘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들의 감정과 의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지역주의가 끊임없이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채원(경영 1): 그런데 지역주의는 결국 경제적 격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닐까요? 영남은 공업이 발달해 노동자가 많은데도 보수적이고, 호남은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진보적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강요된 진보가 아닐까요?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싶지 않아도, 고향의 발전과 본인의 이익을 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치세력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면, 이런 식의 정치색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박수호(경영 3): “낡은 세대의 낡은 감정이 젊은 세대에게 새 옷이 아니라 낡은 옷을 입히려 한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공감이 가는 말이어요.



<지역감정은 왜 해소되어야 하는가?>

오승택(경영 1): 지금 우리나라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통일 문제도 있고, 신흥강국 중국의 성장에 따른 경쟁문제도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안에서 지역감정을 가지고 싸운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에너지를 지역감정에 쏟아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지역감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호영(경영 3): 정말 심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를 너무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미 넘어선 듯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부에서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평균 10 년 정도는 집권을 해요. 여러분, 무능한 정치인이 오랜 기간 집권할 때는 독재로 평가될 수 있지만, 통찰력과 추진력이 훌륭한 정치인이 대통령을 한다면 독재가 아니라 단순한 “장기집권”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장기적인 국가발전 계획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더 무서운 장점이 무엇이냐면, 정권이 바뀌어도 장기간의 국가적 프로젝트를 계속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땐, 우리나라는 여당과 야당이 “국가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win-win 하는 두 개의 당”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경쟁을 하는 승자와 패자”의 구도로 잡혀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국가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물어뜯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다툼 속에서 그들은 ‘지역’이라는 창과 방패를 들고 싸워요. 그래서 전 정권이 뭘 하든, 다음 정권은 그것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지역끼리, 당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도 오승택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선진화 연구모임

윤현수(경영 1): 그런데 그 방안이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뽑히려면 커다란 예산을 끌고 오겠다든가 개발해주겠다던가, 솔깃한 제안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다른 지역과 화합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발전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고 투표를 해줄까요? 그 국회의원이 말하는 것이 전체 국가 발전에 이롭더라도 말이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표를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다른 지역과의 화합보다는 그 지역에만 몰두하지 않을까요?

이희욱(경영 3): 내가 세금을 끌고 와서, 이 지역에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죠? 사실 국민들은 그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이 당장엔 좋아 보이지만, 미래에는 국가는 물론 우리 동네의 발전에까지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에 복지 공약 전쟁이 심했잖아요. 그것이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표만 얻고자 한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사태를 보며 '직업 정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저는 국회를 보며 국회의원들의 '직업 정신'은 온전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치인이라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를 수시로 반성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없는 정치인들이 모인다면 정치판은 추잡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인들은 인기만 얻으려는 포퓰리즘적 공약은 버리고, 진정한 국가 발전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 제도적인 방안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공약평가제도"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공약평가위원회을 구성하여, 매 선거 때마다 공약을 평가하고 이를 언론 매체에 알려 사람들이 공약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지역 간 불균형 발전상태, 해소방안은? >

김채원(경영 1): 요즘 페이스북을 보면 전주맛집이 참 많이 올라와요. 제 주변 친구들도 전주로 굉장히 많이 놀러 갔다 왔고, 실제로도 그 쪽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강원도를 놀러 간다 생각해보면, 좀 막막해요. 너무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더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강원도로 가는 교통이 더 개발되고, 강원도 사람들도 맛집이나 관광지를 더 많이 개발하고 알려서, 자연스럽게 입소문 타고 SNS 에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승택(경영 1): 저는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보았어요. 요새 중국이 많이 성장하는 만큼, 중국의 부유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많이 관광 오잖아요. 따라서 중국과 가까운 호남에 관광지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해외여행을 갔던 경험을 고려해보았을 때, 해안가에 클럽을 많이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나가보면 해안가에 진짜 클럽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가보면 횟집 밖에 없어요. 놀데가 없어요. 왜 그런지 봤더니, 우리나라는 쓸데없는 규제를 정말 잘 안 풀어요. 해안가에 클럽을 왜 못 짓게 해요? 적절하게 규제를 풀면서 해안가에 자본이 자연스럽게 투자되어,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채원(경영 1): 저도 동의합니다. 강원도도 강원랜드 카지노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라도도 관광지에 카지노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하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채원(경영 1) : 그리고 소소한 제안하고 싶은데요. 응답하라 1994 를 보면 여러 지방에서 온 대학생들이 같은 대학을 다니며, 같은 하숙집에서 살아요. 특히 지역감정 싸움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같은 하숙집의 같은 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경남에서 온 삼천포와 전남에서 온 해태는, 처음에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결국엔 절친이 되잖아요.

최영민(경영 3): 맞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지역감정이라는 게 잘 생기지 않잖아요. 심지어 있던 지역감정도 와해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지방 곳곳에서 온 학생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정을 쌓는다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사회를 이끄는 주축이 되니까 결국엔 지역감정도 옅어지지 않을까요? 즉, 지역 간에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승택(경영 1):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지역 간 교류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른들이 이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수련회나 수학여행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남 사람들이 영남에 있는 관광지에 관광을 간다던가, 또는 공장, 회사 등에 견학을 간다던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류'예요. 그냥 눈으로 둘러봐서는, 안 가느니만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끼리 서로 연합해서, 함께 관광이나 견학 같은 행사를 같이 하는 것도 좋고요. 결론적으로 '접촉의 기회'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은혜(경영 2): 맞아요. 이 지역의 학생, 저 지역의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국가적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국가가 아니라도 한 기업이나 한 사회단체에서 주관해도 좋아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사회일수록 더 건전할 것 같고요. 한 명의 사람이 한 명의 사람이 만나서 지역감정이 해소되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작지 않아요. 감정의 해소는 전염이 되거든요.

류호영(경영 3): 네,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7 월 월례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간 소통에 대해 고민했듯, 우리 대학생들도 각계각층에 속하는 사회일원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이 모여 이렇게 생각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진 것이지요!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⑦ 동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제 1차 동국대학교에서 연구모임을 진행하였다.

송동근 (동국대 호텔관광경영 1) : 지금부터 동국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사회자 겸 토론자를 맡은 송동근이라고 합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학생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지역감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생각과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역 간 소통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잡혔는데요. 저는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과 해결책으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정치적 측면이 끼어들기 전에 우리 스스로, 문화적으로 해소시키며 소통을 통하여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렇게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의 정도를 떠나 본질적으로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정치, 경제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갈 전제조건으로 “소통”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문화적 소통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지역축제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양준혁(동국 영문 3) : 개인적으로 저 또한, 앞에서 제시된 송동근 학우의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정치적 법에 의한 억지행위보단 자발적 참여가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해내고 본질인 소통을 향해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기 위해 생각되는 것은 지역 간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인데요. 학생들끼리 각 지역마다 고루 섞여 모여서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누며 갈등을 줄이는 정기적인 모임 같은 것이라도 존재한다면, 어린 기성세대들도 문제를 인식할 수 있으며 어른들도 축제로 인해 변화되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상문 (동국 행정경찰 1) : 여기에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두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저희 세대에서는 지역 간의 소통이나 지역 간 갈등문제의 유무조차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지역 간의 갈등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고 그대로 고질적인 문제로 잡혀있는거죠.

저희들에게도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간 갈등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갈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경상도와 전라도에 더 이상의 갈등은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단지 지역 때문에 다투는 다른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인 것은, 몇몇 소수가 자신이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비하하며 더 큰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이러한 큰 갈등이 단시간에 해결될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선 저 또한 다양한 행사나 축제를 통해서 갈등을 축소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 머드축제처럼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행복의 장을 개최하여, 타 지역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하는 것이 지역 간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서희(동국 고고미술 1) : 저는 추가적으로 문화행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역의 특산품이나 경제특구를 정하고 두 지역이 결합해서 문화행사를 여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 문화행사를 열게 되면 관광객들이 한 지역에 가서나 접할 수 있는 특산품들을 한 곳에서 두 개 이상으로 접해서 좋고 A B 지역의 소통도 많아지므로 관광객도 유치하는 이익을 산출하고 두 지역 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이런 큰 행사를 주관할 능력은 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각 지역 학생의 그룹 반을 통한 학습. 캠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학을 맞이해 타 지역 학생들이 캠프나 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지역 차이와 그 다름을 인지하고 그 지역을 이해하는 활동 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sns 를 통한 활동을 하며 청소년 간 매 달, 매 주 지역을 바꾸며 각 지역의 특산품이나 경제특구에 대해 조사하고 홍보하며 같이 활동한다면 본질적인 지역감정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네트워크가 활발하기 때문에 축제 말고도 온라인상으로 다양한 지역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지역 간의 갈등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게 너무 아쉽고 이러한 문제를 가능하면 빨리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를 통한 지역간 문화적 교류의 장 형성

송동근(동국 호텔관광경영 1) : 사회자로서 의견 하나만 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으시라 생각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주 만나면, 서로 잘 알게 되고, 서로 잘 알게 되면, 서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서로 잘 이해하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역 간 소통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도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구체적인 방안을 해결하는 것까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문제에 대해 알 수 있고 모두가 공감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연현우(동국 호텔관광경영 1) : 저는 지역 간 감정문제를 해결하는데 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 축제에 대한 의견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역감정은 옛 시절부터 이어져 우리 세대까지 전해졌는데 단순 축제만으로는 그리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 주장은 지역 축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해결방법으로는 타당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축제는 현재에도 많이 주최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지역 간 갈등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정치적 측면으로 확장되었을 때는 정부가 이미 만들어진 지역축제를 자신들의 업적 보여주기 식으로 과대 포장할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로, 중요한 것은 우선 어린 기성세대를 시작으로 이런 생각들에 무지한 사람들, 정치인들, 윗 세대들 모두가 정확히 문제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해결방법으로, 지역 축제와 동시에 지역 간 토론 축제도 같이 진행한다면 어떨까 주장해봅니다.

신효빈 (동국 의생명공학 1) :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각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들어보니 거의 다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 듯 합니다.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한 가지 측면만 보면 정답인 듯 하지만 이것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여 정치&법적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주변의 일들을 해결하느라 다들 바쁘고, 이런 전문 지식인들이 아니면 이러한 내용에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책임질 어린 새싹들은 이런 정치와 과거 역사에 무지하고 어른들 또한 비전공자가 아닌 이상 이러한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저는 정치와 법이 강해지는 것이 효율적이고 빠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무엇을 시작하는 확률이 매우 적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어떤 틀을 형성시켜주고 그 안에 넣어둔다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따르고 생각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완성되는데요. 이에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 방법이 너무 극단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여 법의 테두리를 조금이나마 만들고 점점 개발시키고 강화시킨다면 이것이 다른 측면과 비교되게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도 있다 생각합니다.

서연정 (동국 고고미술 1) : 저는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학우분들 모두는 오래 전부터 알게 모르게 지역감정을 가지고 있고 대립되는 지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느 지역출신인지가 중요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선거철 지역감정만이라도 해소가 된다면 거의 모든 지역 간의 감정이 사라지고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소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우리 대학생과 같은 젊은 청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생각을 한다면 지역감정 해소가 그리 멀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지역축제와 같은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행사에 대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며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정부측에서 늘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생각조차 못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대학생들의 인식과 어린 새싹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합니다.

송동근 (동국대 호텔관광경영학부 1) :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외모와 가치관이 모두 다르듯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선진화 연구모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의 대부분의 학우가 지역 간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보령 머드축제 같은 직접적인 만남과 즐거움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에 무지한 대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모두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개진되었구요. 정치, 법적 측면으로 보았을 땐 강제성도 조금은 동반되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 속 깨달음인데요. 많은 이들이 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깨닫는 것이 비록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들이 너무도 많을 텐데 오늘 우리는 그 중 하나인 지역감정에 대해 제대로 느끼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선진화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세계 강대국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과제라고 확신합니다.



젊은이들의 힘!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저희 한국 선진화포럼에서는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소속해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저를 통해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1 차 지역소통의 선진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의견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미지출처
: http://www.kfprogress.org/client/news/viw.asp?sidx=3614

⑧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서경대학교 선진화연구모임

우동식 (서경대 경영 4): 지금부터 서경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역간 소통의 선진화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황예린(서경대 경영 4): 저는 지역적 축제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도 지역의 경제를 손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축제들이 너무 난립한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만 손본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월부터 12 월까지 열 두 달 동안 각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를 쭉 적어봅니다. 그러면 언제 축제가 많이 몰려있고 어느 기간에 축제가 좀 덜 몰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시기별로 축제의 수와 종류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큰 범주 안에서요.

예를 들면 자연, 먹거리, 전통, 패션 이러한 키워드를 몇 가지 정해두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부분을 찾아 시기를 다르게 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인식하기에도 편하고 보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축제를 개최하는 협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 군데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충분히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우선적으로는 너무 난립한 지역적 축제를 슬림화하고 키워드를 정하여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각종 전통시장거리, 무슨 거리 등등 그저 이러한 것들을 조성하는 데만 급급한 형국입니다. 이를 최대한 슬림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축제들을 키워드 별로 몇 가지 정하여 다른 지역 축제와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한다면 지역축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한 지역이 포도축제를 열었다가 조정을 통해 사과축제로 바꾸게 되었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보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묘목이라든지 농민들에게 재배법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다면 초반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한 번 정비하고 나면 명쾌해지고 보다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경대학교 선진화연구모임 2

서인혜(서경대 경영 4): 황예린 학우 의견에 동의합니다. 황예린 학우의 의견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세계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갔을 때 스페인에서 토마토축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 4 대축제 중 하나로 불리는 이 축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관람하기 위해 매년 스페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페인은 엄청난 관광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삼바카니발도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축제로 매년 2 월에 개최되는 행사를 보기 위해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잘 실현한 사례가 보령머드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가지만 가보면 외국인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지역축제를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고 정말 특화된 축제를 찾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연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지역적인 경제불균형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역감정의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어 지역감정이 해소된다기 보다 축제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놀이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동화하여 지구촌인들을 친숙하게 여기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정대(서경대 경영 2): 저도 지역축제 즉 관광산업을 발달시키는 것이 지역 간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파급력이 크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TV 를 통해서 보거나 직접 가본 외국의 경우 이국적이긴 하지만 그리 멋스럽거나 고풍스럽다고 느낄 만한 곳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가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산과 경관이 정말 멋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그 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축제 활성화는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민규(서경대 경영 4): 저 역시도 앞선 토론자분들의 의견에 심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역축제도 축제지만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는 스포츠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것도 이완 연관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됩니다. 스포츠만큼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2002 년 월드컵을 모두 떠올려 봅시다. 정말 우리는 붉은 물결로 하나된 모습을 보였고 전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 번 2012 년에 개최된 런던 올림픽 유도경기를 찜질방에서 관람하였는데 어떤 남자분이 '대한민국'을 외치니까 거기서 TV 를 보던 사람들 모두가 박수를 다섯 번 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외치고 사람들이 더 몰려오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한데 뭉친다면 정말 엄청나고 무서운 힘을 가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찜질방에서의 응원과 여러 국민들의 염원이 통했는지 유도에서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모두가 덩달아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고 웃고 떠들고 환희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한데 뭉치고 함께 응원할 때 단결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국민들의 단결력을 높여준다는 데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스포츠행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동식(사회자): 네 정말 열띤토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방법,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어 대단히 놀랐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사회자로서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에서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했던 지역감정 해소방안에 대해서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과 적극적인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등의 훌륭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간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감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선진화포럼의 선진화 연구모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음 토론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⑨ 포항지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희진(선린대 간호학1): 지금부터 제 1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난 5월 (재단법인)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 주최한 제 87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였던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를 바탕으로, 대학생인 우리의 관점에서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주의의 정의는 '문화적 일체감을 공유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갈등이 정치갈등이 되고 정치갈등이 또다시 지역갈등을 낳는 악순환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갈등이 외국의 사례에 미루어 보아 반드시 타파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김도진(한동대 글로벌리더십1):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있지만 인종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닌 다민족이 함께 각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이 없는 이유는 독재정치 하에 있기 때문인데요.

정치적 자유 혹은 선택권이 없는데다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설 필요가 없는 상황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은 발전을 가로막기도 하는 반면 의사소통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발견되는 각 지역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희(한동대 글로벌리더십1): 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경우, 서독과 남독의 지역갈등이 통일이 된 지금도 온전한 화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한국 안에서 조차 심한 지역갈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경쟁의 의미가 아닌 지역주의가 이데올로기처럼 되어버리는 모습이니까요.

옳고 그름을 꼼꼼히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 단순한 지역적 사상의 문제가 될 경우, 우리나라는 통일을 한다고 해도 더욱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이 되기 이전에 지역정서는 유지하되 지역감정을 해소할 큰 변화와 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희진(선린대 간호학1): 그렇다면 지역정서를 유지하되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요. 문화적 화합과 소통을 함으로서 지역문화를 새롭게 성숙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예로 지역축제가 제시되었는데요, 지역축제가 지역감정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더불어 각 지역의 젊은이 층,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소희(한동대 컴퓨터공학1): 지역축제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지역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 '각 지역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된다' 라는 개념이 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가 조명할 수 있도록 음식, 문화, 예술 등과 같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모두가 좋아할 만한 내용을 담고 우선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지역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모험정신과 도전정신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컨텐츠만 있다면 방학 혹은 학기 중을 이용해서 타 지역 방문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20대들은 과거 심각했던 지역감정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문과 분위기로 경험했던 지역감정을 직접 그 지역에 방문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깨버릴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역특색에 관련된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문화관광요소로 하나뿐인 시설들을 지역마다 배치를 해 놓는다면 방문의 기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중국 심천의 경우 중국의 대역사를 소인국으로 재현해 놓은 마을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는 민속촌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공평한 자본배분과 더불어 정치적 등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지(한동대 글로벌리더십1): 단순히 지역축제가 갈등을 해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제문과 토론문에서 봤듯이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적 불평등이 있어왔기 때문이죠.

우선, 젊은이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호남지역으로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내일로'를 이용해서 젊은이들이 여행을 하는 것이 유행이지만 단순히 지역축제 혹은 짧은 여행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역감정의 해소에 소통이 중요한 요소라면 소통의 장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닌 실제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제안을 하자면, 교사등용 체제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지역감정을 경험하며 자라지 않는다고 해도 가정에서 부모들의 태도는 아이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들은 은연중에 타 지역에 대한 비난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道)단위로 교사를 채용하지만 법적으로 각 지역 교사의 비율을 고르게 함으로 수업시간에 다양한 지역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좀더 열린 태도를 가진다면 학생들의 사고는 틀에 박히지 않게 될 것 입니다.

최온유(한동대 글로벌리더십1): 저는 매우 현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서의 소풍과 수학여행 등의 일시적인 일정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는 것에는 큰 의미도, 효과도 비용에 비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견학의 의미라기 보다는 학교를 벗어난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축제 혹은 지역 탐방의 의미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 움직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온 의견과 같이 경상도에서 전라도 지역으로 가는 데에는 5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잠깐 주변을 둘러본 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견학 또는 현장학습의 모습일 텐데요. 저는 가장 기초부터, 자기 지역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근처에만 가도 도시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은 많을 것입니다.

유적지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자기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타 지역에 대해서도 단순한 정치적 감정 이전에 한 나라의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이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지역감정이자 과거 정치적 요소로 선동된 지역주의는 우리세대가 직접 겪지 않았습니다. 실감이 덜한 만큼 그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 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대들이 느끼는 그 정도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을 잘 지키면서 개인의 판단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이 함께 일구는 성장

이희진(선린대 간호학1): 네, 다양한 의견에 감사합니다. 지역감정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감정이 해결되기 위해서 단순히 문화적 소통뿐만 아니라, 갈등의 시작이 된 정치, 경제적 부분을 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인데요.

지역축제를 통해 음식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컨텐츠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교사등용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세대의 주역인 저희가 좀더 객관화 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우리 지역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지역 간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는 한 발자국 더 선진국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⑩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미디어계열 대학생들이 바라본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는?

조아라(명지디미 3) : 지금부터 미디어계열 대학생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미디어계열 대학생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의 건전한 소통을 돕기 위해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미디어 계열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작지만 소박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은(명지디미 4) : 예능뿐만 아니라 시사교양,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지역별 캐릭터가 등장하고 있죠. 이러한 경향은 방송에서 과장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정된 캐릭터는 고정된 이미지로 시청자에게 인식됩니다.

어느새 어느 지역의 사람은 이러한 경향이 있구나 라는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신문 등 모든 미디어는 수용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라나는 신세대나 지금 저와 같은 20 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요소에서 지역을 구분 짓는 컨텐츠는 다소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수진(숙명미디 3) : 미디어가 지역감정을 부추긴다기 보다는 오히려 일간베스트 사이트와 같은 극우성향의 사이트가 운영됨을 알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제도와 이러한 문제점 실상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것이 언론의 문제인 듯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주은 패널분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러한 캐릭터를 잘 살리는 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광적으로 시청했던 '응답하라 1994'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이러한 컨텐츠로 지역간의 소통을 이루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유정(명지디미 3) : 원래 지역감정을 부추긴 것은 미디어가 맞지만 현재는 지역감정을 넘어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는 이념의 분리로 확대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영남의 정치성향도 보수에 가깝지만 여, 야당의 대립은 자연스레 진보 대 보수의 대립적 구도로 나타난 것이죠.

미디어는 대립적 구도의 보도를 중시하는데, 이것은 매체수의 증가와 미디어의 특징 중 하나인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쏠쏠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양해야 할 것은 미디어는 더 이상 특정계층에 유리한 방향의 보도로 대중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기능인 중립적 시야로 미디어의 본질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진(명지디미 3) : 과거에는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미디어를 선전의 목표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로써 지역감정을 부추겨 지역 간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언론장악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유정 패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가 수용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과장되고 대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건전한 지역 간 소통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특히 선거철이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유진(명지디미 3) : 각 지역이 가진 특정적인 정치입장을 부수는 영상들을 좀 더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미디어를 통해 전달한다면 지역 간의 소통의 선진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유진 패널이 지적해주신 선거철의 미디어의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애초에 미디어에서 특정 후보의 출신지역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건 어떨까요?

최근 여러 기업들의 경우에 입사시험으로 블라인드 면접 등 사람 됨됨이를 보고 뽑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미디어에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해 후보들의 공약 등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미디어환경에서 수용자는 더욱 중립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현진(명지디미 3) : 저희 할머니는 '6 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를 자주 시청하시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할머니와 함께 시청하다 보면 다양한 지역의 특산품은 거의 외우겠더라고요. 하지만 음식 말고는 다른 소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지역의 풍습이나 유적지, 또는 지역축제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할머니와 같은 기성세대 수용자 입장에서도 참여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화 등에서도 부산은 핫한 도시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를 지역에 맞춘 컨텐츠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숙명미디 3) : 저는 지역방송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편성방송이 아니더라도 뉴스와 교양, 시사 등의 분야방송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홍보하고 알릴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지역방송을 전국의 수용자가 함께 볼 수 있다면 좀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조아라(명지디미 3) : 이것으로 두 번째 소주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고 소박한 생각을 많이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여러 매체에서 그려지는 고정된 지역 캐릭터는 고정된 편견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해주신 반면 이러한 캐릭터는 지역 특색을 살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주셨습니다.

또한 지역 간의 정치성향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식의 언론의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언론의 본래 역할인 중립성을 지키는 방향으로의 발전 필요성을 말씀해주셨고요. 이에 따라 선거철에는 미디어 매체에서 후보의 출신지역 등의 정보를 블라인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역의 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다양성을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한 수용자의 권리강화, 더불어 발전된 방향으로 지역방송에 대한 다양화와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환경 외에도 각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지역 간의 소통화의 선진화를 위한 각 분야의 노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소주제 토론과 같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김현진(명지디미 3) :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의 사회는 점점 초고속화 될 것입니다. 교통의 발전은 곧 여러 지역시민들이 서로 왕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사회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서 교통비 절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용이 아닌 노령층 인구와 젊은이들이 쉽게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의 교통비 절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론 진행자께서 쓰신 글의 일부에서도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저도 안전에 대한 노력은 최우선으로 하되,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은(명지디미 4) : 저는 미리 읽어본 칼럼에서와 같이 전국에 퍼져있는 대학들이 각자의 색을 가지고 주력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입학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형태가 아니라 전국에서 어느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 대학이 위치한 대학교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수도권 집중현상도 완화될 것 같고, 대학 순위별 줄세우기가 아닌 전공분야 특화가 이뤄져 연구성적 또한 매우 향상될 것 같습니다.

박유진(명지디미 3) : 저도 이주은 패널과 같은 의미에서 중앙집권적인 자치가 아닌 지역단위별 지방자치가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너무 중앙에만 집중돼있는데요. 적절한 기회분배와 사회적 소통의 노력을 사회다방면으로 지속한다면 인식의 전환과 서로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숙명미디 3) :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일단 지역 간의 소통을 위한 사회문화적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창, 인천 등 유명 스포츠 행사가 열릴 지역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특색을 홍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의 장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거부감이나 편견들도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아라(명지디미 3) : 네, 감사합니다.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해 교통설비 증강, 교통비 절감부터 시작해 전국 대학들을 기초로 한 전공중심 대학 구조조정, 지방자치의 강화, 사회문화적 화합의 장 조성 등의 의견까지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지역 간 소통의 선진화를 위해서 미디어계열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디어계열 학생 여러분들의 소박하고 참신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른데요. 지역 간의 소통의 선진화, 오늘 우리의 선진화 연구모임 토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상으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패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선진화 과제 32: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

(제 89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김초아(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는 대한민국,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높은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불리기엔 2%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이 문턱을 넘어 정직, 배려, 준법정신이 가득한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지난 10 월 30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89 차 월례토론회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 발표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 주제발표를 맡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강남구에서 시행한 5 대 불법 무질서 추방운동 등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진행과 성과에 대해 소개했고, 준법의식 활성화에 대해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박승호 前포항시장은 감사 퍼포먼스 대회, 감사운동 시범학교 운영, 감사방송실시 등 포항시에서 실제 행했던 감사운동 성공사례를 발표했고, 허남석 포스코 ICT 상임고문은 '행복한 리더가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리더와 책임자의 적극적 참여와 감사나눔 운동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따른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염홍철 前대전광역시 시장은 우리나라 압축성장의 부작용이 성과주의, 배금주의로 인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자존심을 추락시켰고, 무한경쟁의 압박으로 인해 공존, 배려 정신보다는 배제와 독식이라는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불신사회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다시 뛰는 한국사회, 왜 지금 지자체의 선진시민운동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지금 한국사회는 기초와 기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라며 지자체의 선진시민운동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한 '선진 시민 교육'이 필요할 때!

다섯 분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나머지 2%의 과제는 바로 '선진시민의식의 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질적 발전 속도에 비해 선진시민이 가져야 할 책임의식 등 기본적 덕목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는 곧 공동체간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결핍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풍부한 사회적 자본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발시켜 건강한 민주주의로의 근간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진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근대국가에서는 정부 중심의 통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요?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우리는 변화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그만큼 기업이나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의 역할이 늘어났지요. 정부는 조향(steering)역할을 할 뿐, 모두가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시대입니다.

선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또한 더 이상 정부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민단체, 즉 민간의 역할이 완전히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유기적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한 선진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공공 이슈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메타플랜교육법

선진화된 시민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 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물론 강남구, 대전시 등에서 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보다 시민 중심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방식을 조금 더 능동적인 형태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흔히 '참여식 교수법'이라고 불리는 '메타플랜(metaplan)'방식처럼 말입니다. 이 교육방식은 회의나 협상 등 어떤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 자주 이뤄지는데요, 시민사회 교육에 있어서도 지루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공공 이슈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민간 단체의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교육이 아닌, 지속가능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민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선진 시민의식의 정착이 이뤄진다면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참가자의 규모나 의제설정, 제대로 된 교육자 양성 등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국 교육처럼, 시민 교육 또한 좀 더 능동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선진 시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를 희망해봅니다.

② 김태준(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의 문턱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몇 계단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 그 단계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 힘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진 국민으로서 시민의식 함양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시민의식을 정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지난 10 월 30 일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89 차 월례토론회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 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 신연희 강남구청장님, 박승호 전 포항시장님, 염홍철 전 대전광역시장님께서 연사로 나오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시민의식을 함양했던 사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염홍철 전 시장님께서는 좀 특별한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염홍철 전 시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도가 방향성 측면에서 일정부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민, 국민에 대해서 너무 계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전시행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효과를 얻으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하셨습니다.

필자 역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을 함양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선 그 표현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은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양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 스스로 의식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고 할 때, 파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듯 남의 강요나 지시가 아니라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넛지효과'라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방지턱 역시 넛지효과의 사례이다

리처드 탈러 시카고 대학교 교수와 카스 선스타인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공저인 「넛지」라는 책을 통해서 넛지효과의 우수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강요나 지시를 할 때보다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했더니 화장실의 청결도가 80% 향상했다는 사실은 이제 유명한 예시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요나 지시로 인한 행동은 단기적인 효과를 지닙니다. 이에 비해 자연스럽게 유도된 행동은 장기적인 효과를 지닙니다.

과제를 생각해봅시다. 강요되거나 지시된 과제의 경우 필자도 그렇지만 대개 짜증을 유발합니다. 과제를 완성하고 제출한 이후에는 그 과제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자연스럽게 유도된 행동의 경우 짜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깨우칠 수 있다고 믿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산파술'을 사용했습니다. 산파가 산모를 도와 아이를 출산하듯이 철저히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침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행동과 유사성이 많습니다.

강요된 지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기만 할 뿐, 이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스스로 깨우친 지식은 인지를 넘어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한

지식을 통해 다른 지식으로 파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민의식의 함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이 스스로 이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행정부 역시 우리나라의 국민 스스로 시민의식을 함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행정부는 시민 스스로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그 체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쓰레기가 많은 길거리가 있다면 휴지통을 늘리면 됩니다.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잦은 도로는 방지턱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 국민은 저절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③ 김현성(이화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과)



새마을 운동은 1970 년대부터 시작되어 근면·자조·협동의 덕목을 강조하는 잘 살기 운동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온 국민이 한데 뭉쳐 실천하여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이끈 원동력이기도 하죠. 이를 보면 국가의 발전은 국민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선진국이란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시민의식의 부재가 상당수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10 월 30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월례토론회에서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 라는 주제로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의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회에는 박연수 시민의식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많은 연사 분들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시민의식을 함양했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박연수 위원은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이 몸에 배여 있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뤄야 함을 강조하시며 인성과 규범이 함께 가는 것이 선진 시민의식의 해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성에 있어서 좋은 인성보다 나쁜 인성이 더 쉽게 나타나 규범이 더욱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유지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 예외 없는 엄한 단속도 밑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규범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어느 한 명이라도 일탈이 가능하다면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박연수 위원님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를 보면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시민의식부터 정치수준, 국가청렴도, 경쟁력 등등 여러 면에서 세계의 상위권에 랭킹 되어 있어 선진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이러한 평가를 받는 싱가포르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경범죄와 관련하여 질서 유지를 위한 법들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다던가, 금연구역에서 흡연, 길거리에 침 뱉기, 무단횡단 등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강력한 법안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위와 같은 질서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식 수준과 당국의 허술한 단속에 있습니다. 그럴듯한 법을 만들어 발표할 때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은 분위기이지만 막상 시행은 작심삼일이며 단속은 용두사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서 불감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를 제대로 지키면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 오히려 상황봐서 적당히 질서를 무시하면 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깊게 박혀있습니다. 규범을 경시하는 이러한 풍조가 만연한 비 시민적 문화에서 시민의식의 선진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강력한 정책 그리고 자발적인 국민의 동참으로 의식구조 혁명을 일구어 내면 충분히 시민의식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범국가적 캠페인 추진이 중요

그러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범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인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캠페인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법치주의원칙을 준수하도록 감시, 비판, 견제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양하는 등 캠페인의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전문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도 리콴유 수상이 직접 나서 정부 주도로 추진한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범국가적인 캠페인인 '예절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기까지 9 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도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같은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면 점점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닌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세계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성과 규범을 드높이기 위한 범 국가적 캠페인의 활성화를 희망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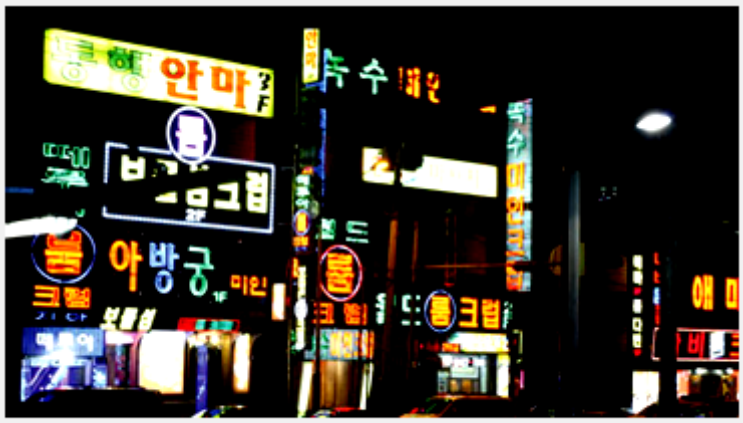
④ 류호영(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프로그래머와 게임캐릭터,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

과거 유행했던 PC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아시나요? 이 게임에서는 프로그래머의 조작과 계획에 따라 게임 안 유닛 캐릭터(unit)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프로그래머의 명령에 따라 자원을 구해오는 유닛, 공격기지와 방어기지를 건축하는 유닛, 적을 공격하는 유닛 등 각자 업무를 도맡지요.

프로그래머의 계획과 유닛들의 실행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정해집니다. 게임 승패의 공로와 잘못은 유닛보다는 프로그래머에게 돌아갑니다.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유닛들의 노력과 희생이 존재하였지만, 프로그래머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승리를 전혀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학급이든 직장이든 어느 조직을 가도 리더(leader)와 그를 따르는 팔로워(follower)가 있습니다. 고대국가든 중세국가든 현대국가든 시간에 관계가 없이 둘은 공존합니다. 과거 1960 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국민들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승리를 거두었듯이 말이죠.



유흥 1번지 강남

지난 10 월 30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를 운영하는 리더들을 모시고 선진시민운동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강남을 한국 대표도시를 넘어 국제도시로 비상하도록 만들기 위해 전개해온 활동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들이 헐뜯으며 계획을 저지하고자 할 때에도, 물러서지 않고 확고한 신념과 남다른 추진력으로 강남을 선진화하는 패기가 참석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물론 이미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대유행으로 강남은 '선진도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관광객들과 외국 바이어들의 방문을 받게 된 강남은 의외의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 퇴폐도시의 대명사가 바로 강남이었던 것입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365 일 24 시간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다양한 고품격 문화를 생산하는 강남의 긍정적 이미지 이면에는 밤거리의 퇴폐문화라는 이미지가 숨겨져 있기에 이것이 강남구의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전개하며 5 대 불법 무질서 추방운동을 기획 및 실행하였고 그 중 가장 빛을 발한 것이 "퇴폐행위 근절"입니다. 각종 홍보캠페인으로 운동을 펼치는 동시에 신연희 구청장님은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 나섰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은 '불법퇴폐행위근절 T/F 팀'을 전국 자치단체로는 최초 신설하여 불법 퇴폐·유흥업소 근절에 적극 나섰습니다. 단순한 단속으로는 퇴출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팀을 구성한 덕분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입건이 빠르게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적극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릉·강남·역삼역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낙엽처럼 뒤덮여있던 퇴폐업소 전단지를 없애기 위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명의를 추적하여 대포폰임이 확인되면, 명의자에게 "성매매에 쓰이는 대포폰이니 계약을 해지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대포폰이 무력화되면서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의 연결고리를 아예 끊어버릴 수 있었고, 거리에 휘날리던 전단지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범적인 행정방안으로 손꼽혀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갈 정도로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고용, 탈세 등을 집중 단속하여 작년에만 영업정지 600 여건, 행정처분 2 천 300 여건을 내렸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성매매의 온상이 되어온 대형 관광호텔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유흥주점을 완전히 퇴출시켰습니다.

이때 적반하장으로 관광호텔들이 고소를 해올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행정처분이 3 년이나 걸리는 문제가 있기도 하였는데요.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퇴폐업소를 근절시킬 수 없다며 법제처에 직접 건의하셔서 이제는 관광진흥법으로 6 개월 내에 관련 업무가 처리되도록 법규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불법퇴폐업소의 영업을 묵인한 건물주에게도 중과세를 물리고 벌금을 내리고, 불법건축물은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외 처리하기 힘든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이나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을 찾아내어 성매매 업소를 척결하였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즉, 사소한 불법이나 무질서의 방치는 나중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연희 구청장님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행정에 적용하여, 작은 불법과 무질서라도 묵인하지 않고 정비하고 시정하고자 하셨고, 그 결과 선진도시를 만드는 데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괄목할 정도로 놀라운 '창의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리더의 뛰어난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퇴폐업소 근절 운동을 실시하는 와중에 뭇사람들의 비난을 듣기도 했지만 누가 뭐라 해도 추진해나갔다며 강인한 의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남구의 리더의 계획을 믿고 따른 팔로워의 팔로워십에도 감탄합니다. 리더와 팔로워가 합심하여 운동을 펼쳤기에 나타난 놀라운 성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훌륭한 리더 아래서 만들어진 환상적인 팀워크의 힘이지요.


리더로서의 책임

사실 현 신연희 강남구청장 이전에 많은 리더들이 이 강남구청장이라는 자리를 거쳐 갔을 것입니다. 모두들 강남의 유흥 1 번지라는 불쾌한 타이틀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이만큼 노력한 강남구청장님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과연 조직과 사회 발전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태만과 나태를 버리고, 잘못은 고치고 비효율은 개선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자세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진정한 리더이고, 그가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감사나눔' 운동 또한 병행하시고자 하는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같은 리더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강한 의지를 가질 때에서야 범인이 리더가 될 수 있고, 그 리더가 모든 이들에게 찬사를 받는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적·육체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마다의 능력 차이를 가름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입니다. 정신적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정신적 능력을 가진 인재로서, 리더가 되어, 팔로워가 되어, 이처럼 능력을 힘껏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⑤ 박성찬(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수많은 명사들의 조언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막연하기만 하다

우리는 수많은 멘토와 명사들의 조언, 과거의 명언 등 성공을 향한 다양한 조언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말아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등등 이런 조언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 별처럼 막연하기만 합니다.

이런 답답한 가운데 필자는 추동화 "쥬피터익스프레스' 대표이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가장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은 바로 '운동'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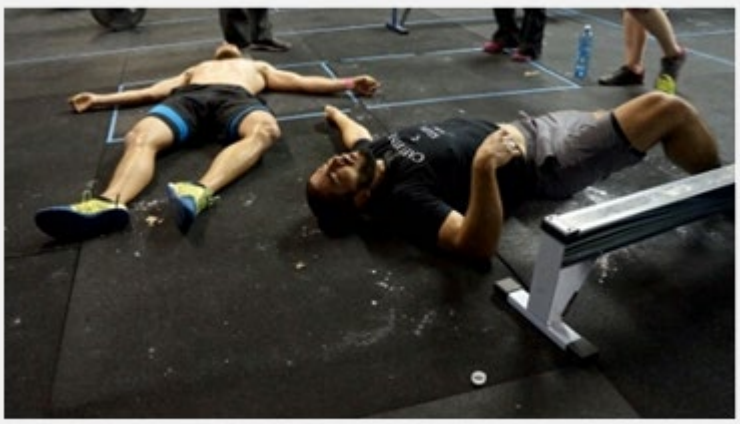
운동은 단순히 몸을 예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다

흔히들 운동을 다이어트나 몸매를 만드는 '도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손님이 바로 '운동' 인 것을 보아 운동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추동화 대표이사님께서는 운동의 가치에 대해 다른 그 무엇도 운동만큼 정신력, 끈기, 인내, 도전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의 결과에만 집중했던 우리는 운동은 곧 몸매를 예쁘게 한다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아름답기에 더욱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이들을 바라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만 더, 한번만 더를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잡은 횟수를 위해 힘들어도 버티는 정신력, 그냥 포기하고 편히 눕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는 인내와 끈기, 마주앉은 라이벌을 이기겠다는 도전정신, 이 모든 것을 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몸매는 이에 딸려오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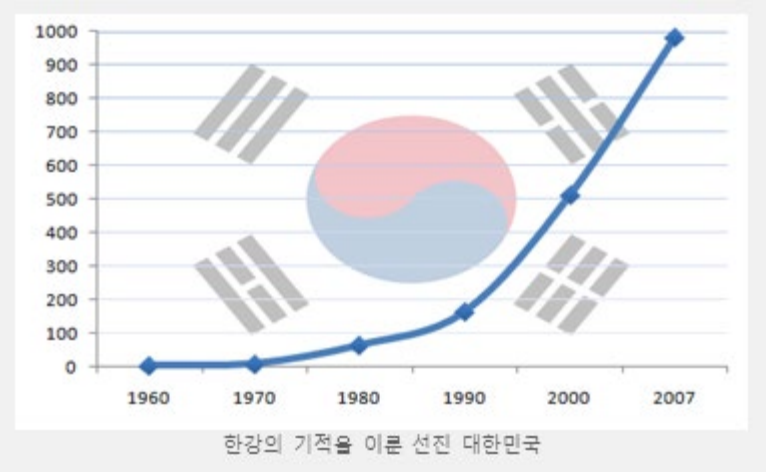
포기하고 드러눕고 싶은 유혹을 견디는 끈기, 인내, 정신력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한 습관을 갖고 싶다면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뒤지며 방법만을 찾기보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 2km 만 멈추지 않고 뛰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km 도 못 가 뛰는 것을 포기하고 걷고, 멈추고 싶어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때부터입니다. 2km 를 뛸 때까지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참아야 합니다. 무조건 2km 를 채우고 나서 그 기분을 느껴보시기 원합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참고 인내해서 얻는 쾌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맛일 겁니다.

성공을 너무 멀리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2km 를 쉬지 않고 뛰는 이 작은 목표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높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원하는 목표를 참고 견뎌내어 그 위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책상에 앉아있는 당신이여, 지금 당장 일어나길 바랍니다!

⑥ 송동근(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선진 대한민국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나라는 꾸준하고 변함없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이루고 경제를 성장시켰다 하더라도 이에 감사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비약의 성장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은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 즉, 국민들에게 있다.

아무리 나라가 외부나라에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라고 주장하여도 국민들과 시민들, 아니 우리들이 '우리의 대한민국은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이다.'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는 선진화된 시민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어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 불릴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지난 10 월 30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를 주제로 89 차 월례토론회를 주최해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각 지자체의 장들을 초대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성공한 선진시민운동 사례를 통해 지자체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힘을 실어준 이야기들을 듣고 실천한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에 많은 도움을 준 성공사례들을 발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5 대 불법 무질서 추방 운동'을 발표하며 준법정신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이야기를 발표하였다.

또한, 박승호 前 포항시장은 현재 포항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참여하여 실시되고 있는 '감사운동'을 소개하였으며 이어서 토론자들은 선진시민의식의 정착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허남석 포스코 ICT 상임고문은 행복지수가 성과몰입도를 높인다 주장하였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선진시민운동이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기 위해 가정, 직장, 사회와 함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영홍철 前 대전광역시 시장은 극도의 불신사회에 대한 수치를 말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생각해보았을 때 지자체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우선, 문제의 본질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순위라 생각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문제의 본질을 안다면 점점 해결될 것이다.

그 예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남다른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힘을 쓰셨다. 그것은 바로 "퇴폐행위 근절"로 역동적인 강남의 불법퇴폐행위와 유흥업소 근절에 손 뻗어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단속하였다.

이러한 결단은 행정처분으로 형사입건이 빠르게 진행되어 적극적인 근절 성공사례로 남고 있다.

또한,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는 관광호텔의 불법행위도 묵인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당당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성과를 얻어낼 수 있던 이들의 결단력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보이지 않는 곳과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나라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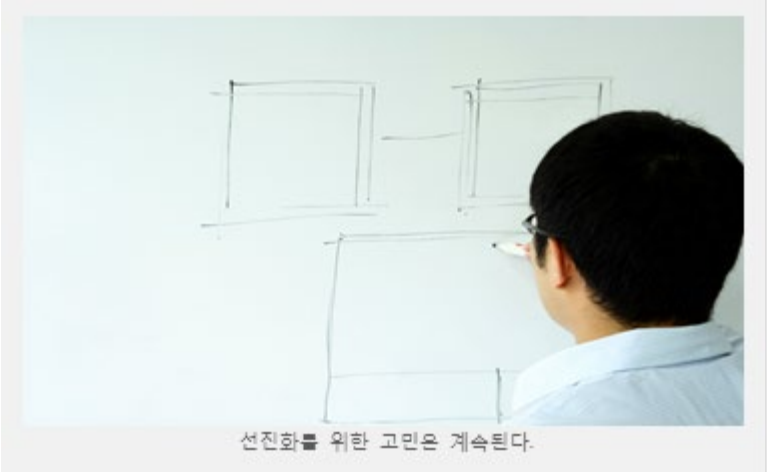


이러한 것들은 초창기, 더욱 영향력이 강해지기 전에 미리 치유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흔히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 비유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진 유리창을 보고 나도 깨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깨진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치료해 깨끗한 100% 순결의 유리창으로 만들어 내는 마음과 행동이다.

이러한 마음들이 지자체나 정부, 국민들과 국가의 가슴 속 안에 있다면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25 위가 아니라 세계 선진화국 1 위가 될 날이 머지 않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⑦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과)



평소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적인 부분을 한 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지 않지만 국민들의 의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우리의 경제력을 발전시켜준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선진의식 가꾸기 운동'을 제 2 의 새마을운동 삼아 국민들의 의식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자체 단위의 특색 있는 캠페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관내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적인 행태들을 강력하게 근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감사함을 전하고 직접 노트에 적어보는 '감사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훌륭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평소의 생각을 더하여 '선진의식 가꾸기 운동'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캠페인의 핵심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긍정'은 변화의 출발선입니다. 긍정의 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작용하는 강력한 에너지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 선진의식을 배양하고 선진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사하기.

‘선진의식 가꾸기 운동’의 첫 번째는 ‘인사하기’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편의점 직원, 버스기사님, 회사동료 등등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그저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함께 일을 하는 직장동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언제라도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마다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평소에 ‘인사 하나 잘해서 손해 볼 것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어느 곳에서나 상대방에게 가볍게라도 인사를 건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침에 등교를 하며 버스에 탈 때도 기사님께 인사를 꼭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후배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꼭 먼저 인사를 합니다. 특히 웃어른을 만나거나 청소를 해주시는 분, 경비아저씨들께는 늘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인사는 받는 사람의 기분도 좋게 만들지만, 먼저 건네는 사람 역시 기분을 좋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보통 두 세 달에 한 번씩 시내에 있는 대형서점에 들르곤 합니다. 신간을 구경하기도 하고 많은 책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고 동시에 나태해진 마음가짐을 바로잡기도 합니다.

서점 화장실을 이용하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평소처럼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이용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그 아주머니께서 비타민음료를 주시며 올 때마다 인사를 해줘서 고맙다고 제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지나치듯 했던 인사를 기억하시고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후에도 여운은 오랫동안 남았고 그 날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사는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깝게 만들어 주고, 내 주위의 사람들과 보다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기쁨으로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미소짓기.

두 번째는 '미소짓기'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은 80 년대 지하철 내에서 각종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뉴욕에는 가더라도 뉴욕지하철은 타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전 세계인들 사이에 농담처럼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시당국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지하철 내의 낙서지우기, 무임승차단속 등의 사소한 범죄들을 단속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강력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던 때와는 달리 자연스럽게 강력범죄가 감소하였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은 '깨진 유리창 이론'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중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작은 것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작고 사소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미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소는 웃음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은 나아가 각 개인에게 행복한 인생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미소는 짓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지만 보는 사람의 기분도 함께 좋아지게 합니다. 또한 미소와 웃음은 주변으로 퍼져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미소를 지으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미소를 지을 것이고 주변이 미소로 가득차면 사회전체로 퍼질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기.

세 번째는 ‘감사하기’입니다. 필자는 한국선진화포럼에서 받은 감사노트를 활용하여, 2014 년 7 월 11 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노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해야 할 일을 다섯 가지씩 적고 있습니다.

감사노트를 처음 적을 때는 참으로 난감하였습니다. 감사할만한 일을 찾기 어려웠는데 당시에는 주변의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게는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일부러라도 감사할 일을 찾고 생각하였습니다. 작성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이런 것도 감사를 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초반에는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속적으로 감사노트를 작성하다 보니 저의 의식이 많이 변화하였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남을 탓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잘되면 내 탓, 안되면 조상 탓’식의 남을 탓하는 분위기는 결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한 각종 대형 사고와 사건들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해지고 아전인수격의 이기심이 횡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들을 스스로가 일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진의식을 갖춘 국민과 선진화 사회의 건설을 이루기 위한 해답은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은 변화의 출발선이며 ‘선진의식 가꾸기 운동’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선진사회를 위한 변화의 중심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당장 선진의식 가꾸기 운동의 세 가지 핵심과제인 ‘인사하기’, ‘미소짓기’, ‘감사하기’를 실천해보세요. 작지만 커다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⑧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으나 시민의식은 그러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식은 이러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선진화의 문턱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어떻게 하면 이 문턱을 넘어 선진사회로 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를 주제로 지난 10 월 30 일에 월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례의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배용 한국선진화포럼 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신연희 강남구청장, 박승호 전 포항시장,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세 분이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연수 고려대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허남석 포스코 ICT 상임고문 등 세 분이 지정토론을 했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확산, 불법 성매매 근절 등을 통해 선진도시로 다가가고 있는 강남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감사운동을 통해 행복 도시로 변하고 있는 포항의 모습과 감사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압축성장의 부작용과 불신 사회가 된 우리 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방법 및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연수 고려대 교수는 교육을 통해 좋은 인성을 형성하고 동시에 규범을 유지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엄한 단속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시민의식의 기초와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은 교육을 통해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남석 포스코 ICT 상임고문은 감사운동으로 포스코 ICT 직원들이 행복해진 것과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에 대해 말하며 감사운동을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자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운동으로 행복도시가 되어가는 포항시

저는 여섯 분의 토론을 보고 박연수 고려대 교수님의 주장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법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선진시민의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전 이것을 초등학생 때 직접 몸으로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3 학년 때의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나쁜 행위이며 하지 말라고 말로만 말씀하실 때 학생 중 반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더러워졌습니다.

교실이 더러워지자 선생님께서는 말로만, 즉 교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들에게 반성문, 청소 등 벌칙을 부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교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흡연과 무단횡단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표시를 보고도 금연표시가 있는 그 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을 자주 봐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가 없는데도 몇 분 빨리 가겠다고 차가 보이지 않으면 무단횡단을 거리낌없이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워왔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TV, 신문, 인터넷 등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금이라는 처벌과 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에 좋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의 법이 좀 더 엄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한 흡연, 무단횡단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과중한 벌금을 물리고 의식개선 교육을 의무로 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벌금만 과중하게 물린다면 단속에 지금보다 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반발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함께 병행한다면 자신이 잘못했음을 납득하게 될 것이고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갖게 되는 동시에 벌금이 싫어서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시민의식은 계속해서 개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선진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육과 벌금강화는 간단한 방안이지만 효과적으로 우리 나라의 시민의식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인들에게 독일과 일본같은 선진시민으로 보이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⑨ 이희진(선린대학교 간호학과)



현재 우리나라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 화려하고 튼튼한 성곽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기반이 약한 성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처럼 선진국의 기본인 선진시민의식이 결핍된 우리나라는 위태로워

보이기만 한다.

더 위험한 것은, 시민들 스스로가 시민의식의 결여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의 의지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기본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을까?

지난 10월 30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를 주제로 89차 월례토론회를 주최하여, 각 지자체에서 성공한 선진시민운동 사례를 통해 지자체 활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준법정신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5대 불법 무질서 추방 운동'사례를, 박승호 前 포항시장은 현재 포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감사운동'을 소개하였다. 염홍철 前 대전광역시장은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하며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선진시민의식의 정착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허남석 포스코ICT 상임고문은 행복지수가 성과몰입도를 높인다 하였고,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선진시민운동이 일상 생활 속에 녹아나기 위해 가정, 사회, 직장 그리고 교육이 함께 가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연수 특별위원은 인격은 '형성되어지는 것'이므로 인격을 지키고 일탈을 막아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양정호 교수와 박연수 특별위원의 주장에 주목하여 가정교육이 선진시민의식 운동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정에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부모의 교육이 있고 형제 간, 부모자식 간에 지켜야 할 예의와 가족 내 규칙이 있다. 핵가족화 되며 과거에 비해 그 정도는 감소했지만 인격을 형성하고 행동의 척도가 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교육사상가 페스탈로치는 '가정은 도덕의 학교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인성과 품성도야(品性陶冶)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선진시민의식은 어린 영 유아기 때부터 서서히 함양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할 때에 가정교육은 만년지대계(萬年之大計)이어야 한다고 함은 곧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필자는 가정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부모교육에 힘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에서는 예비부모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지자체는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과 부모는 물론 자녀들이 갖춰야 할 선진 시민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어느 부모도 자녀가 범법행위를 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선진시민의식 또한 개선되지 않을까?



부모교육은 필수이어야 한다

내실있는 성을 쌓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시민의식이 굳게 자리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선진시민의식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교육과 규칙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예비부모교육 및 부모교육을 실시해 예비 선진시민을 함께 양육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탄탄한 내공으로 선진국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⑩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포항시의 감사캠페인은 시민의식을 가꾸는 데 유의미한 모범사례이다.

지난 10 월의 월례토론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동'과 포항시의 '감사 캠페인'이 지자체의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성공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필자는 OECD 행복지수 꼴찌라는 우울한 현실에서 이 같은 실천적 노력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각 지역의 마을합창단 조직, 마을신문 창간, 마을기업 창업, 마을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200 개가 넘는 마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층간 소음, 아이와 놀아주기, 화단 가꾸기, 벽화 그리기, 품앗이 육아공동체, 청소년 문화카페 등인데요. 이는 이웃 간의 친목을 강화할 뿐 아니라 공동체에 관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대대적인 감사운동 또한 유명한데요. 감사 나누기 운동 1 년 만에 시민 행복도가 55.8->62.2 로 상승하는가 하면, 포항의 대표기업 포스코는 감사나눔운동을 적극 실천하여 직원 행복지수 95 점이라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초, 중, 고교의 졸업식 문화는 감사 편지와 리본을 달아주는 감사졸업식과 감사입학식을 통해 자라는 학생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동과 포항시의 감사운동은 별개의 차원이 아니며 근본적인 면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공동체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공동의 노력은 주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지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방글라데시같은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행복지수 1 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특별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것들, 즉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기뻐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한경쟁의 압박 속에서 누구나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옛날에 비해 살기 좋은 시대로 바뀌었다고들 말합니다. 20 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빈곤율과 문맹률은 세계적으로 바닥이었지요. 70 년대에 앞뒤 안 가리고 오로지 부국강병과 경제개발만을 추구한 것을 기점으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한국사회는 엄청난 경쟁사회인데,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모든 면에서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놓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이 워낙 격변적인 속도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인 생활 여건의 극적인 상승을 가져왔지만,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패배의식 또한 따라온 것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한국사회가 '헝그리 사회'에서 유례 없는 '앵그리 사회'로 변화되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합니다.

가족, 친구, 집, 음식, 몸의 건강 등 일상의 소소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 마인드는 긍적적인 에너지로 삶의 활력소가 될 뿐 아니라 뇌혈류량을 높여 창의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공화주의자 키케로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입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고, 개인적인 발전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감과 이해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⑪ 정복윤(고려대학교 정경학과)



월례토론회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의 모습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무엇일까요? 한 국가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도 국민이 그 선진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선진화의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즉, 선진시민의식 성숙이 선진국이 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진시민의식의 필요성을 느껴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10 월 30 일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선진시민운동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월례토론회를 통하여, 선진시민운동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연희(現 강남구청장) 주제발표자는 강남구 선진시민운동 정착운동의 추진내용 및 우수사례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박승호 (前 포항시장) 주제발표자는 포항이 오랫동안 시도해온 '범국민 감사운동'을

소개하며 감사운동을 통해 얻는 다양한 효과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염홍철(前 대전광역시장) 주제발표자는 신뢰와 관용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정부의 신뢰성 회복과 시민역량의 강화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박연수(시민의식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 토론자는 교육을 통해 좋은 인성을 형성하고 동시에 규범을 유지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엄한 단속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복으로 이어지는 포항시의 '감사나눔운동'

허남석(포스코 ICT 상임고문) 토론자는 감사나눔운동을 통해 보아온 기업발전의 결과를 보여주며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토론자는 '기본이 바른 사람'이 절실하며 '교육'을 통해 '생활주변에서 시작되는' 시민의식성숙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필자는 양정호 토론자를 통해 '교육'과 '생활 주변'의 두 키워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인성은 어릴 때 형성되기 쉬우므로 시민의식교육을 통해 큰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의식은 저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생활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 이를 가까이서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생활주변',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인 '학교 교실'을 잘 활용한다면 성숙한 시민의식의 형성방안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할까요?

필자는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을 전제로 하고, 교실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정직', '책임', '공경' 등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는 어린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 말 그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각 반에서 매주 '시민의식 활동자'들을 배정하여 이들에게 한 주 동안 시민의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한다면 극복될 수 있습니다. 매주의 '시민의식 활동자'들은 자신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고쳐주는 역할까지 맡게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한 주 동안 활동한 뒤 활동내역에 대해 정리해보고, 반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은 뒤,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면 선진시민활동의 효과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는 한 그룹 내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책임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시민의식을 수호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선진시민으로서의 행동에 대해 깊이 관여한다면, '활동자'가 아닌 앞으로의 기간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비행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숙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천하기에 이미 습관이 너무 많이 굳어져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는 곧 습관을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잡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성이 형성되는 학교 내에서 그런 습관을 잘 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그룹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으면 '책임감'을 갖듯이, 학급 내에서도 실제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 시민의식을 실천하도록 유도해주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한국이 시민의식이 성숙한 국가로 인정받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⑫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선진화의 문턱에서 겪고있는 가치관의 혼란은 우리사회의 불안요소 입니다

'꽃을 뽑아가지 마세요' 이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한 대형화분에 있는 나무푯말 문구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꽃을 심어놓으면 며칠도 되지 않아 누군가 뽑아가기 때문에 내건 푯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선진화의 문턱에서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은 우리사회를 고통과 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턱을 넘어 '정직', '배려', '준법정신'으로 따뜻하고 살맛나는 선진사회로 갈 수 있을까요?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모두가 공감하는 선진화 덕목을 국민에게 확산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10 월 30 일 89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의 성공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내가 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러 성공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0일날 열렸던 (재)한국선진화포럼 89차 월례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5 대 불법 무질서 추방 운동'을 통한 선진시민의식의 정착운동 모범사례를 소개했으며 박승호 포항시장은 '범국민 감사운동 추진'으로 시민의 인성함양과 이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염홍철 배재대 석좌교수는 다양한 사례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연수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교육을 통한 시민인성 형성과 규범유지를 위한 엄격한 단속을 주장했고,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시민의식의 기초와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남석 포스코 ICT 상임고문은 감사운동을 통한 경영실적 향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승호 포항시장의 '감사운동'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단하지만 결코 모두가 하지 않는 작은 실천으로 인성함양, 긍정적 마인드, 잠재력 개발, 생산력 향상, 창의성 증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행복한 가정과 학교, 사회를 만들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선진 시민의식 정착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적 '참 잘했어요' 스티커에 착안한 '고맙습니다' 스티커는 어떨까요?

저는 이 감사운동에서 더 나아가 나도 누군가에게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감사받기 운동'을 생각해봤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감사'라는 말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이를테면 "자리를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귀는 나도 모르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합니다. 이렇듯 사회적 표현에서 '감사'라는 말을 상용화하고 더 자주 쓰도록 유도해 시민들의 감사하고 감사받는 의식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선진 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의식 정착운동에 참여하면 '고맙습니다'라는 작은 스티커를 각 집 대문에 붙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기'운동이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때마다 한 장씩 배부하는 스티커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눈과 어른들의 입가를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네 아버지 시절에는 공병이나 폐지를 모아 구청에 가져다 주면 새로운 공책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에 착안해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모으면 생활에 필요한 폐유비누를 주거나 각 생필용품을 나눠주는 나눔의 인센티브를 통한 선진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받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선진시민사회. 우리가 만듭시다!

저는 이번 월례토론회를 통해 거대한 담론이나 거창한 시도도 좋지만 우리가 정작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기'는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그 뜻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감사운동과 더불어 내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역발상, 또한 이러한 감사운동을 통해 함께 나눔을 실천한다면,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신사회를 뛰어넘어 선진 시민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는 "꽃을 눈으로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꽃을 이 곳에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푯말은 꽃도둑의 마음을 저리게 하는 따끔한 감사받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서울대학교에서 제 3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였다.

박성찬 (서울대 재료공 3) : 먼저, 서울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시민사회로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선진시민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자체 단위의 노력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감사도시포항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식 향상 캠페인 실시.

박한서 (서울대 재료공 2): 저는 지자체 행정 서비스를 통한 선진시민의식 정착 노력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포항시의 경우 감사운동을 실시했습니다. 127 개 초, 중, 고 77000 명 대상, 일반인 30000 명 대상 감사노트쓰기를 실시하였고 감사방송, 감사대상 공모전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업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감사운동을 실시한 공무원의 경우 업무실적이 올라갔으며 학생의 경우는 평균 벌점 점수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20 개 기관, 단체에서는 벤치마킹하기 위해 포항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노력이 단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변화시킨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봤을 때 지자체의 노력도 정책성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군포시에서 개최한 독서대전.

박성찬 (서울대 재료공 3) : 저는 역시도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제가 사는 군포시는 책 읽는 군포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독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독서대전, 출근길에 책 한 권, 독서 골든벨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됐습니다.

그와 더불어 도서관 설립, 도서관 예산 증가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했는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독서와 가까워질 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각 도서관의 도서보유량과 도서대출량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주현 (서울대 재료공 3) : 저는 지자체의 노력이 다소 과장된 결과를 말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들을 보더라도 과연 감사운동의 결과가 업무성적과 평균 벌점 점수에 얼만큼의 영향을 준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다양한 원인의 결과를 단순히 한 원인의 결과로만 말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자체의 노력은 보여주기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 저는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단체의 협력도 동반되어야 완전한 형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업소 강제 철거

강남구청의 경우는 많은 지자체들이 캠페인이나 보여주기식에만 머물던 퇴폐업소 퇴치 문제를 민관 협력 구도로 접근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폐업소의 비율을 상당한 비율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민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풍 (서울대 재료공 3) : 저도 오주현 학우와 비슷하게 그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성과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박성찬 학우가 말했던 것처럼 책 읽는 도시를 슬로건으로 걸었을 때 실제로 독서 대출량, 서점 독서 판매량이 늘었는지 구체적인 기준으로 성과를 표현했을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찬 (서울대 재료공 3) :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노력이 아닌 시민 스스로 과연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이 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심재건 (서울대 재료공 3) : 저는 시민으로부터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 년대 들어서 활발해진 NGO 활동이 자생적인 환경을 가지고 지금껏 이어져오고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개최한 캠페인들이 실제 변화를 가지고 온 사례들을 보면 희망적인 전망이 가능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성숙하지 못한 여러 사례를 보며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상태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항상 뒤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보아 시민의식의 성장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염세주의, 냉소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김정은 (서울대 재료공 2):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진 안타까운 특유의 모습 때문에 시민차원의 선진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한번엔 타올랐다가 다시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냄비근성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슈가 된 사항에 막대한 관심을 보이다가 오래 가지 못해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의식의 고취 역시도 매번 제기된 이슈지만 항상 그 결실을 못 맺고 사라지는 것을 보아 시민에 의한 선진시민사회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반복할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듭니다.

이경풍 (서울대 재료공 3) : 김정은 학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정적인 특성을 얘기하셨다면 저는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유의 저력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랜 식민 생활과 전쟁의 여파로 폐허가 된 나라를 이만큼 성장시킨 것은 바로 국민들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얻은 민주주의 역시도 얻어냈다는 점에서 이 특유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진국으로의 마지막 관문인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 역시도 우리 국민의 특유의 저력으로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걸고 싶습니다.

박성찬 (서울대 재료공 3) :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실효성이 있을지, 시민들 스스로가 시민의식 향상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서울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우선 지자체의 노력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예시를 통해 실제 지자체의 노력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자칫 보여주기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끝으로는 강남구청의 예시를 들며 지자체 혼자서가 아니라 민간단체와도 협력한다면 자칫 의심받을 수 있는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완전한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자체가 아닌 시민 스스로에 의한 시민의식의 향상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2000 년대 이후에 다양한 시민단체의 행보와 산업화, 민주화를 이끈 국민의 저력을 보았을 때 시민들 스스로의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보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 특유의 성향 중에 금방 타올랐다 금방 식는 특징을 예시로 매번 제기 되었던 이 문제가 발전없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을 보아 시민으로부터의 변화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선진시민사회를 이룩하기를 기원한다

이렇듯 시민의식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들 인정하지만 이 주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모든 의견이 공통적으로 민관이 협력된 형태를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봤을 때 앞으로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방향으로는 지자체, 시민 이렇게 각각이 아닌 민관이 손을 잡고 협력하는 게 그 방향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제 3차 서울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가졌다.

임현수 (국문 4): 지금부터 제 3 차 서울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10 월 30 일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를 주제로 열렸던 월례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관한 대학생들의 관점을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월례토론회에서는 강남구청의 '불법 무질서 추방'운동, 대전광역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동', 포항시의 '감사 캠페인'이 지자체의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성공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포항시의 감사 나눔운동의

경우 시민 행복도 증가와 초중고교의 감사 졸업식 문화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주제는 좋은 인성을 형성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인성에 기반한 선진시민의식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데 있어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이고, 풍요를 넘어서 품격 있는 인간으로 가는 길입니다. 토론자분들은 지금부터 좋은 인성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헌 (국문 4): 저는 월례토론회의 박연수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인성은 형성되며 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점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한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은 살아온 세월만큼 누적되어 만성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인성을 교화하는 것보다, 그렇게 만든 환경과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임현수 (국문 4): 어떤 의견이든 괜찮습니다. 저 또한 좋은 사회에서 좋은 인성이 자리 잡고 나쁜 사회에서 나쁜 인성이 자리 잡는다고 봅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김주영 (성악 2): 환경과 문화가 개인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 공감합니다. 저는 성숙한 인성과 배려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지나친 경쟁 일변의 문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강요하는 각박한 현실이 곧 만연해 있는 이기주의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지요.

안준영 (농생명 4): 우리나라의 근로문화와 취업난을 생각해 볼 때, 직장인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든지 간에 항상 야근을 오랫동안 한다고 하십니다. 현대나 삼성 같은 곳에서 매일 밤 9-10 시까지 일을 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나가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의 분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 현장에 있는 직장인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김주영 (홍익화공 2): 기업은 어차피 주는 연봉 가지고 직원으로부터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고용을 더 늘리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것이 기업의 이익을 증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안준영 (농생명 4):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목적 또한 감안해야 하지만, 결국 지난 수십 년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우리나라의 기업 근로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도현 (경제 4): 우리나라 10 대 기업의 현금 보유율이 100 조원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고, 여러 기사를 봐도 오너들이나 임원들, 재벌들은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사회가 점점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득공 (동국물리 4): 기업들의 실적이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다는 반론이 나올텐데요.

박인우 (지환 3): 그런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줬으니 너희들은 노예처럼 시키는 거 다 하면서 계속 일만 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보다는 일이 그만큼 많으면 사람이라도 더 고용해서 한 사람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직장인들이 모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성악 2): 동감합니다. 우리사회가 남의 성공을 배 아파하고 칭찬하지 못하며 서로 물어뜯고 공격하는 앵그리 사회가 된 것도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근로 문화가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기업 문화와 부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와 같은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도현 (경제 4): 기업을 바꾸려면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야 하고 정부가 바뀌려면 유권자가 바뀌어야 하는데, 정작 서민들 다수는 부를 분배하자는 주장을 종북 혹은 빨갱이라고 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

윤득공 (동국물리 4): 맞습니다. 낙수효과로 대기업이 한국 젊은이들을 살려주고 있는데 무슨 고용증진이냐고 도리어 따지겠지요.

서명범 (국문 3): 퇴근만 빨라져도 외식을 많이 하게 되고,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생겨서 여기저기 여가활동을 하며 돈을 쓰게 되면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아이도 더 낳게 되겠지요.

안준영 (농생명 4): 근로문화를 개선할 획기적인 방법은, 사기업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기본급의 300%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새로 직원을 쓰는 게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말입니다. 지금은 시간외 수당이 너무 적지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고 일하는 시간인데 보통의 근로시간과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현수 (국문 4): 문화를 통해 설명하려는 건 그럴듯해 보이지만 환원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문화로 설명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딱히 해결책도 보이지 않으니 쓸모없는 탄식과 단념으로 이야기는 종결되어 버립니다. 저는 그런 악습을 제대로 규제하고 징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안도현 (경제 4): 저는 고용노동부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 담합 근거가 있는데 공정위의 조사가 안 들어가면 문제가 되고, 탈세 혐의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조사를 안 하면 문제가 되지요.

하지만 유독 근로기준법이 무시되고, 법적으로 근로자 권리가 보장이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는 사업장인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현실입니다. 기업별로 세무 조사하듯 근로문화를 털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명백한 위반임을 알고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지요.

임현수 (서울국문 4):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한 인격은 아동 시절부터의 훈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성을 교화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만든 환경과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사회가 남의 성공을 배 아파하고 서로 물어뜯고 공격하는 앵그리 사회가 된 근본 원인으로 지나친 경쟁 일변의 문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언급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근로 문화가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높게 책정하여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고용노동부가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의 강한 압력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결국 기업 문화와 기득권, 그리고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앵그리 사회'는 끝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인품으로 바꿀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스템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숙한 시민사회와 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3 차 서울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고려대학교에서 제 3차 선진화연구모임이 열렸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식은 이러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선진화의 문턱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 월 30 일에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토론회의 내용 중 일부를 뽑아서 대학생 버전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이준수(고려대 식자경 1) : 시민의식은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태도 또는 마음의 자세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민의식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독립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시민의식은 유전적, 또는 자연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과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인 경험을 토대로 시민의식은 형성됩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을 기본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인간을 '시민'이라 합니다. 요즘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신승연(고려대 식자경 2) : 저는 시민의식을 여러 갈래로 나눠서 생각해봤습니다. 그 갈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갈래 중 하나인 준법의식에 대해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준법의식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인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1960 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행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는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준법의식을 함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꾸준한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 함께 법을 지키자고 주입해도, 현재 본인만 법을 지키고 있고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경제적 이윤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준법의식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 시민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시민의식으로는 안전의식이 있는데 이는 최근에 세월호 사고와 잇따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이윤추구로 인한 준법의식 부재, 시설물에 대한 법의 감시 약화는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감시를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치와 관련된 민주시민의식은 시민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만 함양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무관심하게 되면, 소수의 정치인에 의한 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뽑은 대표자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감시가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1) : 저는 시민 스스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사회의 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낮은 시민 의식을 가진 민주주의 사회는 잘못된 사상에도 시민들이 쉽게 선동당하기 때문에 그릇된 정치적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태동했던 고대 그리스에서도 여자, 외국인, 저학력자 등을 제외한 시민권을 가진 남성만이 참정권을 가졌는데 이는 계급주의 인식이 팽배해서라기보다는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진 자들만이 정치에 참여하여 효율적인 민주정치를 구현하려 했던 합리적이며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교육을 통해 시민 의식을 높이면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문화적, 학문적 소양 함양을 위한 공교육만으로는 정치 참여에 적합한 수준의 시민 의식 함양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만 보아도, 역사와 사회 수업 등을 통해 민주 의식에 대한 교육은 많지만 결국 이는 교육으로만 그치고 실질적인 시민의식 함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sns 등의 대중 매체들을 통해 잘못된 정치적 지식을 갖고 선동당하는 일들은 아직까지도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의 '세월호' 사태나 이명박 정권 시절의 '광우병' 파동 등 특정 이익집단으로 인한 정치적 선동은 유효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이처럼 공교육을 통한 올바른 시민 의식 함양은 어렵습니다.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공교육을 넘어서는 고급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모든 시민들이 받는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중들의 시민 의식을 개혁하는 것은 크나큰 사회적 비용이 드는데다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고급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엘리트들이 선전을 통해 정치적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낮은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이러한 엘리트들의 선전을 통해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임성균(고려대 식자경 2) : 저는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한 공동체에서의 바람직한 행동양식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개인이 함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내의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전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워야만 어느 정도의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어린이들을 생각해봅시다. 미취학 아동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한 뒤에 주변의 반응을 바탕으로 이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혹은 잘못된 행동인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의 사례가 다 큰 어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상당히 개인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시민사회에서 상호관계에 대한 의식은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폐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야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상호 관계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행동과 그에 대한 정서가 공감이 되어야만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각종 행위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그

기준점은 구성원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 행위인가에 대한 것일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배척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기본적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광고나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공감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라든지 도로 미관을 위한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이런 상황이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진 이유는 사회 전체에 이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펴져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시민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퍼트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시민의식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박예슬(고려대 식자경 2) : 저도 임성균 학우와 생각이 비슷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직 후진적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가 이 후진적인 사회를 선진화해야 합니다. 폐수에 맑은 물을 부어봐야 폐수만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 폐수, 즉 사회를 맑은 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민 스스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경한(고려대 식자경 2) : 지금까지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해봤습니다. 오늘의 토론에서 시민 스스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후진적이라서 이 사회에 있으면 똑같이 후진적인 시민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근거였습니다.

이 사회를 선진화하는 방안으로는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것,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며 낮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것, 공익광고나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선진사회로 나아갸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는 것 등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제시된 많은 의견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3차 선진화 연구모임이 진행되었다.

정복윤(고려대 정경학부 1) :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경제선진국, 복지선진국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진화포럼이 주최한 10 월 월례토론회는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많은 과제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소주제를 잡았고 이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선진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또는 환경에 대한 방안'이며 두 번째 주제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인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선진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또는 환경에 대해 각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방송매체라던가 SNS 등 파급력이 큰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체에서 선진시민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의 파워를 이용하자!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지하철에서 어른을 홀대하는 한 청년의 모습이 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댓글에서 청년의 모습을 상당히 지적하였고 특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모습을 제 3 자의 입장에서 본 사람들은 나중에 당사자가 되었을 때 행동을 조심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선진시민의식을 아무리 배워도 지키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체 등을 통해서 제 3 자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스스로 깨닫고 사회적 인식 등을 알 수 있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윤(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번 주제에 대해 접근했습니다. 저는 사회가 법과 정치가 상호작용해서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선진시민의식을 가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법'인지에 따라 사회의 모습도 다르다

먼저 법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가해자가 잡히지 않으면 신고자가 처벌받는 법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도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데에 몹시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들을 단지 시민의식으로만 비판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민의식을 실천했을 때 보상받는, 최소한 피해는 받지 않도록 제도가 잘 구축되어야 하겠죠.

정치적 측면에서는 부패가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패척결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것이, 시민의식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할 여지가 큽니다. 이는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본웅(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선진시민의식에서 준법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존중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법을 준수했을 때 자신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준법의식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즉, 법을 지켜도 자신의 이익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 정윤학우의 말씀과 맥락이 비슷하지만 결국 법으로 감시와 처벌이 올바르게 행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법의 허점을 노려 이익을 차리는 세력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들을 보며 준법의식을 갖춘 시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이끌어주어야 하겠죠.

서정원(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행위에 대해 제한된 정보가 주어진다면, 또는 한쪽 측면에서만 설명한다면 시민들은 그 행위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의 혼란이 생길 것이고 잘못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았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선진시민의식을 갖춘 행위가 아닐 수도 있죠. 즉, 매체에서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정보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의 부족이 해결되어야 하겠죠.

강민서(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경제적인 밑바탕이 깔려있어야 한다고 봐요. 맹자는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서도 일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선비만이 가능하다.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밑바탕이 시민의식에 깔려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법과 규율도 잘 잡혀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교실바닥에 쓰레기가 많아졌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훈계해도 쓰레기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에 대한 벌칙을 한 분단 전체의 연대책임으로 정하자 곧바로 쓰레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시민의식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규율 강화가 잘 잡혀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복윤(고려대 정경학부 1) : 네 토론자분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방송매체 활용, 대학 내 체제 변화, 규율 강화, 부패척결, 경제적 풍요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인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회화가 되어있으면 이타심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타심을 발휘하지 적합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타심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팽배한 '경쟁'을 조금 풀어주는 것이 이타심 발휘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경쟁은 이제 그만!

그 방안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심화된 대학서열화를 완화시키고, 대학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로 사람이 대접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길을 다양하게 열어주고, 사회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이 기능해야 합니다. 독일의 마에스터 제도와 같이 청년들의 노동력을 각 분야에 분산시키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육성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죠.

서정원(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의 인성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를 엄하게 교육해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인성을 다잡을 수 있겠죠.

이에 더불어 부모의 칭찬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시의 감사나눔운동과 비슷하게 칭찬을 받으면 감사를 받듯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시민의식 함양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

구본웅(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도 정원 학우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짚고 가고 싶은 점은 과연 부모가 자식에게 긍정적 영향만을 물려줄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혹여 어떤 부모들은 준법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 그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출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점은 부모가 올바른 시민의식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시대에게 그 책임을 물자면 현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모든 구시대의 책임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현시대, 저희 세대부터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추고 올바른 시민의식이 정의라는 것을 깨닫고 후세대에게 그 가치관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정윤(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시민교육을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철학을 접하면서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자기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뛰어난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시간에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시민교육을 실행한 외국사례를 접했는데 효과가 꽤 컸다고 하더군요.

심재인(고려대 정경학부 1) : 저는 인성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도 교실 밖에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등학생 때에는 기본적인 도덕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중학생 정도 수준이 되면 올바른 시민의식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도덕책을 한 번 더 읽는 것보다는 교문 밖을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등의 실행적인 시민의식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 도움도 주고 자기 스스로도 시민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윤(고려대 정경학부 1) :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소주제에 대한 토론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경쟁을 완화시켜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 올바른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고차원의 시민교육이 활용되어야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실 밖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선진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또는 환경에 대한 방안과 이기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인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앞당겨지길 바라며 이것으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에서 열린 제 3차 선진화 연구모임

김현성(이화 방송 4):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3 차 모임에서는 시민의식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선진국이란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시민의식의 부재가 상당수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지 않고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과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의식부분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할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임소현(이화 작곡 3): 사실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면 시민의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해 무고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들의 흡연도 세계 1 위입니다. 또한 신호등을 지키지 않거나 차선 끼어들기가 원래 법인 마냥 여기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입시에서도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수준의 심각함을 알았습니다.

이 슬(이화 방송 4): 맞습니다. 시민의식 부재로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비용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 경찰청에서 도로혼잡료나 교통사고 등 법질서 파괴로 부담하는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며 이를 아낄 경우는 잠재성장률을 3% 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국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준법정신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함희수(이화 광홍 4): 저는 지난달에 벌어졌던 판교 환풍구 참사 또한 개인들의 시민의식 부재가 만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 측의 부실한 안전관리도 문제지만 저에게 둘 중 어느 쪽에 사고 원인의 비중을 더 두느냐고 물어온다면 주저 없이 전자를 꼽을 것입니다.

물론 업체 측의 안전관리 문제야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개인의 시민의식 부재를 부각시키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나 하나쯤이야 하며 사소한 질서조차 잘 지키지 않는 현상이 몸에 배어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생활 주변 어디에서건 쉽게 관찰이 가능하죠.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이들이 겪어야 할 시간 낭비나 비용 따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며 그저 내 몸 하나, 우리끼리만 편하고 이득을 얻으면 그만일 뿐이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그날도 필시 그랬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자신의 키보다 조금 낮은 위치의 환풍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평소라면 그곳에 절대 올라갈 일이 없었겠지만, 다른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볼 요량으로 과감하게 밝고 디뎠을 것입니다.

이단비(이화 방송 3): 매우 공감합니다. 개인 일탈 행위의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장에 늦게 도착하여 자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그룹을 반드시 봐야겠다고, 이성을 잃은 채 안전의식 따위 내팽개치고 환풍구 위로 올라서서 마구 뛰어오른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시민의식은 정작 급박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슬(이화 방송 4): 저는 청소년들의 질서의식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공연장에서 휴대폰 벨소리를 울리게 해 놓거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면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친구들끼리 떠드는 학생도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해외로 이민 가서 사시는 저희 이모께서도 서양 사람들은 아이들이 식당 등에서 떠들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사정없이 혼을 내는데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아이를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한국 사회를 보면 질서 의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현성(이화 방송 4): 네,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 부재의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갖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함희수(이화 광홍 4): 이슬 학우께서 말한 것에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사회가 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은 유교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그 자체로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윤리로서 '옳은 규정이기 때문에 지킨다.' 는 식으로 보는 것이죠.

법은 그 자체로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서양 기독교 사회의 율법정신과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제 우리사회도 강한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법정신이 일상화된 서양에서는 범법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는 무관용 정책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강력한 규범체제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소현(이화 작곡 3): 동의합니다. 싱가포르는 시민의식부터 정치수준, 국가청렴도, 경쟁력 등 여러 면에서 세계상위권에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평가를 받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질서 유지를 위한 법들이 매우 강력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는 이들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쓰레기 투기를 하면 초범일 경우 1000 달러, 재범일 경우 두 배인 2000 달러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벌을 주고, 껌은 아예 수입 금지 품목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화장실 물을 내리지 않는 것, 집 앞의 고인 물을 치우지 않는 것 모두 다 엄중한 벌금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슬(이화 방송 4): 저는 우리나라에 합리적 이기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식은 개인의 이익추구에서 출발하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의 이익 추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시민의식이란 각각의 이익에 기초하면서도 그들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도덕 원칙을 합리적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신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신호등을 지키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모두에 손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인 잇속만을 챙기는 똑똑한 바보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신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합리적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하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시민사회가 성숙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단비(이화 방송 3): 저는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바람직한 인성과 문화를 다시금 우리의 교육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 고등학교 모습을 보면 온통 성적과 입시뿐입니다. 때문에 학교에만 전적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책임을 떠맡기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죠.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 중심의 방과 후 학습운영이 아닌 외부에서 교육 봉사 재능기부를 받아 효 교육, 공중도덕, 타인배려, 준법정신, 기초질서, 등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 메뉴얼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능기부 교육 봉사자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의 가치관, 경험 등을 학생과 같이 공유하면서 학교, 가정에서 미처 가르치지 못한 큰 틀의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희수(이화 광홍 4): 저는 우리나라에서 NGO 들의 준법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양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시민의식의 변화를 주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청결을 위한 민간 캠페인은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의 쾌적함을 크게 개선 시켰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같은 캠페인이 이루어지도록 장려라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과 관계없는 순수한 범국민 수준의 자발적 시민운동을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시민의식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성(이화 방송 4):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시민의식부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의 미성숙한 점에 모두 동의하며 우려 높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서양의 율법정신계승, 싱가포르와 같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강력한 정책 규제 마련, 합리적 이기주의의 정착, 재능기부 교육 봉사를 통한 인성교육체제 마련, NGO 들의 준법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양하는 자발적 캠페인추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비 시민의식 문화가 소멸되는 날이 빨리 오길 희망하며 토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7일 제3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했다.

손민지(이화교육 3) :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리 전달했다시피 지난 10 월 30 일에는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를 듣는 (재)한국선진화포럼 89 차 월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이번 연구모임에서도 선진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연구모임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도덕교육론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바, 도덕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선진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현아(이화교육 3) : 우선 선진시민의식을 기르는 문제를 왜 도덕교육으로 접근하는지 언급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덕은 사색의 영역이 아닌 삶의 실제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도덕교육은 인간이 공동체에 적응하고 자신의 행위를 공동체에 조화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린 세대들을 선진시민의식을 갖춘 사회적 존재로 길러내고,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덕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아동의 도덕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지만,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등 가정의 형태가 변화되고 성적향상만을 강조하는 풍토가 증가하면서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위와 같은 가정이 아니더라도 가정은 사적 유대와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사회의 공적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적 품성을 길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를 연계하는 하나의 훌륭한 가교로서 학교,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슬이(이화교육 3) : 도덕교육은 인간이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얼마 전 만화캐릭터 '피카추'를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서 시민들이 문화유적을 밟았다고 하죠.

문화유산을 밟으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이 없었다면 이것은 도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시민의식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도덕교육을 전개하려면, 우선 교육을 하는 부모와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동은 권위자의 행동이나 특성을 닮고, 그것을 자신의 판단과 행위의 준거로 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가 옳고 그른 것을 꾸준히 강조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되겠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혹은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으로 습득하게 된다면, 아동의 죄책감은 무뎌질 것입니다.


만화캐릭터 '피카츄' 쇼타임 행사를 보기 위해 문화유산을 밟은 시민들

임소리(이화교육 3) : 저는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행위규범을 '당연한 것'으로 강조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동의 이해를 통해 규범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는 왜 지켜야 하는지, 분리수거는 왜 해야 하는지 등 생활 주변 작은 일부터, 뇌물수수, 비리, 횡령 등이 왜 나쁜지, 선거를 왜 해야 하는 지 등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들까지 정당한 근거와 행위 규범의 가치, 의미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해시켜야 합니다. 시민의식을 왜 높여야 하는지도 교사가 설명해주면 좋겠죠?

정민지(이화교육 3) : 저는 아동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도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아동의 행동에 대해 일관성 있는 칭찬 혹은 벌이 있어야겠죠.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를 통해 시민의식의 수준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다고 합시다. 이 사람에게 칭찬을 보낸다면 이 행동은 강화되겠지만, '착한 척 한다', 혹은 '가식적이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쓰레기를 줍는 행위가 감소하겠죠.

개인이 아닌 기업을 예로 들어 봅시다. 어떤 기업이 큰 금액을 기부했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현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 행위는 반복되겠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기부는 감소할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긍정적 결과가 주어지고,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역시 그에

걸맞은 불유쾌한 결과가 주어질 때 정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동이 정의로운 인성을 갖추고 선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상과 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수경(이화교육 3) : 아동이 남의 행동을 보고 자기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역사적 인물일 수도 있으며, 이야기, 영화, 연극 속에 등장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아동이 도덕적인 인물을 본받고 비도덕적인 인물의 행동에선 '옳지 않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민지 학우의 의견에 깊이 동의합니다. 예컨대 성적향상만을 중시 여기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도덕성보다 성적향상에 더 많은 칭찬과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도덕수업에서는 도덕성을 강조하게 될 지라도 성적이 최우선이고,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암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이지만 성적이 높아 교사들의 칭찬을 받는다면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의 모습을 닮으려 할 것입니다.



교사는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도덕 단계 향상을 도모한다.

정윤아(이화교육 3) : 저는 아동의 도덕 단계가 향상할 수 있도록 도덕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과 경험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도덕 수업시간에 도덕적 갈등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토론하고 의사소통하게 함으로써 도덕적인 자극과 도전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덕 문제에 대한 토론과 의사소통을 넘어, 보다 넓은 삶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도덕 단계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참여와 역할 채택의 경험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학급과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생활의 조건, 즉 삶의 제도와 구조, 정책, 질서를 평가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급과 학교 공동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공동의 삶에 필요한 규범을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공동의 복지증진과 이익,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절차 등을 정의롭게 수립한 후, 이를 준수하고 운영해 보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도덕적 사고와 행위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손민지(이화교육 3) : 네,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도덕교육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우선 도덕사회화로서의 도덕교육을 강조하며, 선진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왜 학교현장의 도덕교육이 중요한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바른 도덕교육을 통해 아동의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가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도덕규범의 행위를 교육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유를 설명해 아동의 이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도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행위에 대한 올바른 보상, 즉 칭찬과 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갈등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토론하고 의사소통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실생활 속에서 경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도덕적 사고와 행위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도덕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토의해보았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열성적으로 토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1. http://www.youtube.com/watch?v=bczb-S5Uz3E
2. http://www.youtube.com/watch?v=gTgwYXUU6RQ

④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11월 8일에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제 3차 선진화연구모임

김초아(숭실대 행정 3) : 지금부터 숭실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시간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현재 어엿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 성장으로 인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서로에 대한 불신 팽배, 준법의식 부족, 공동체의식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문턱을 넘어 정직, 배려, 준법정신이 가득한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민교육'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선진 시민교육이 어떻게 행해져야 할지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양해나(숭실대 행정 3) :김초아 학우의 말처럼 현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올바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김초아 학우는 시민교육을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거버넌스적 시민교육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김초아(숭실대 행정 3) : 네. 저는 시민의식의 선진화,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서 참여식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유기적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거버넌스식 교육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참여 위주의 교육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시민단체의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교육 방식은 지루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 형식의 '메타플랜(metaplan)' 교육이나 이와 관련한 포럼 개최 등 '시민 참여식 교육'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양해나(숭실대 행정 3)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은 어떨까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말입니다. 저는 시민교육이 생애 전반에 걸친 '평생학습'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09 년 교과부에서 지정한 '평생학습계좌제'와 같은 보다 장기적이고 실용성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정규 학교교육 이후 모든 국민의 교육을 관리하는 것인데, 학위나 교육받은 이력 등을 등록하면 학습이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경력관리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언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관리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올바른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민교육으로까지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교육을 이수한 것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주고, 많이 참여할 수록 다른 강의를 공짜로 제공한다던지 뭔가 이에 대한 소소한 보상도 주는 것입니다.



김지혜(숭실대 영문 4) : 저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교육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평생학습체계가 국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지역 단위로, 지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지역마다의 여건,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독일의 오펜바흐 시민대학을 아시나요? 유구한 지방자치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독일은 교육 분야에서 또한 16 개의 주정부의 독자적 결정, 책임을 통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이 너무 강하다 보면 교육의 효과가 약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조사해보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독일은 지역 단위 시민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학습하는 지역들(Lernende Regionen)'인데요, 지역의 교육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관, 단체들이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2001 년부터 시작을 했고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예산 지원 경우에도 점차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설정해 프로그램의 자립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최근 들어 이러한 선진국의 평생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고 많이 배우려는 것 같은데, 독일처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시민교육을 하되, 서로 효과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활발한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윤(숭실대 경영 4) : 여러 학우분들이 시민교육에 있어서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의 학교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진화된 시민의식. 이 '의식'이라는 부분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생각해왔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교과 외의 활동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늘리는 겁니다. 그저 내신 점수를 위해, 대학 입시를 위해 하는 억지로 된 봉사 말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취지에 맞는 봉사활동이 필요합니다.

양해나(숭실대 행정 3) : 맞아요. 학교에서 제대로 된 시민교육이 먼저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같은 활동도 좋지만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컨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남극의 눈물'에서 나온 '펭귄의 허들링(Huddling)' 같은 소재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영하 50~60 도에 육박하는 추운 남극에서 황제펭귄들은 서로의 몸을 밀착하고 바깥쪽에 있는 펭귄이 안쪽에 있는 펭귄을 감싸 추위를 막아줍니다. 바깥 쪽의 펭귄이 힘들 때쯤에는 서로 위치를 바꾸며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이렇게 서로를 아껴가며 돕고 살아가는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재의 문화컨텐츠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더불어 사는 법'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견뎌내는 황제펭귄의 허들링(Huddling)

김태현(숭실대 경영 3) :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과 외적으로는 과연 얼만큼, 어느 정도 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사정도 다 다르고 주 5 일제 시행, 또 앞으로 9 시 등교가 활성화되면 교과 진도 나갈 시간도 촉박할 것 같은데 시민교육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는 최대한 수업시간, 즉 교과 안에서 시민의식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체육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체육 시간에는 축구, 배드민턴,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규칙'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민의식의 부족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인데, 체육시간의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규칙과 질서가 꼭 필요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로 함께 협력을 이루어가며 하는 활동이니만큼 공동체 정신 함양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육을 통한 자연스러운 학습효과와 건강 증진. 건강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갖춘 선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요즘엔 예체능을 경시하고 국영수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강신우(숭실대 영문 4) : 김태현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질서의식, 준법정신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래 예(禮)를 중시하는 민족인데 요즘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 때문일까요? 무조건 '빨리 빨리'를 외치며 신호위반과 과속, 무단횡단을 일삼는

사람들... 얼마 전 우연히 독일 아우토반 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지나가는 영상을 본 적 있는데, 구급차가 지나가자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모두가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한참 모자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였더라면 차로 빽빽한 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얼마나 빨리 병원으로 도착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대구의 '구급차 길 터주기 운동'처럼, 우리나라 또한 선진시민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차가 지나가자 일제히 길을 비켜주는 독일 고속도로의 모습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질서, 규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교육 같은 의식적인 측면과 더불어 강제성을 조금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통 질서 등에 대한 범칙금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시민들의 신고정신 또한 투철해서, 만약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면 바로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요. 최근 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약 58%가 교통범칙금 인상에 찬성의사를 표현했을 정도로 독일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엄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이나 처벌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를 보완할 적절한 강경책을 섞어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준법정신이 투철한 선진국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초아(숭실대 행정 3) :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선진시민의식'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토의해보았습니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생각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토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임에 공감을 표했으며, 선진시민교육에 대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한 토론위주의 시민교육 방안과 교육을 담당할 시민단체와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2. 평생학습계좌제를 적극 활용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의 중요성.
3. 독일의 오펜바흐 시민대학 같은 지역 위주의 교육 활성화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 간 교육 네트워킹.
4. 봉사활동 참여, 멀티미디어 교육을 통한 학교에서의 교과 외적인 시민교육 방안.
5. 체육시간(교과 내 시민교육)을 통한 자연스러운 시민의식 체득.
6. 의식 수준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질서와 규칙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에는 장기적인 안목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미래를 향한 '선진시민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새마을 운동과 같은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진출처>
2. 펭귄 허들링 (mbc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
3. 독일 고속도로 (http://www.youtube.com/watch?v=VL-tPgcrLHE)

⑤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한양대학생은 시민의식 함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김태준 :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선진국에 매우 근접해있으며 곧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발맞추어 시민의식을 역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시민의식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필요한지, 특히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윤성 : 우선 우리나라에 시민의식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흡연구역에서 버려진 담배꽁초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결과중심, 특히 학업에 대한 강조만 들었던 나머지 도덕과 같은 다른 부분에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에 좀 더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의 쓰레기는 시민의식 부족으로 인해 비롯된 문제인가?

이명성 : 물론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통해서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다른 원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 다른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길을 걷다가 쓰레기통을 찾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느낀 점은 우리나라 길가에는 정말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길가 쓰레기통'이라는 검색어를 쳐보시면 왜 우리나라 에 쓰레기통이 부족하냐는 성토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시민의식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설정비와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경환 :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수인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수인한도란 내가 '어느 거리까지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들고 다녀야지'라는 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쓰레기통 간의 거리가 사람들의 수인한도보다 멀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쓰레기를 주로 던져서 버린다는 특성상 쓰레기통의 입구를 넓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가에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는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김태준 : 너무 논의가 쓰레기통에만 국한되어서 제가 약간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민, 국민들에게 스스로 시민의식을 향상, 함양할 능력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영 :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스스로 시민의식을 함양할 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를 감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약간 사찰과 같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법, 규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전에 대규모 시위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단체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마이크를 이용하고 주위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규칙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 저도 한 마디 하자면, 정부가 굳이 나서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근을 주는 행동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같이 정부는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령 법무부에서 시행했던 '슈퍼급훈 K'와 같은 공모전이 시민의식 고취를 유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적절한 급훈을 선정하게 해서 우수한 것에 대해 포상하는 대회였는데요. 공모전이나 발표대회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성 : 그래도 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적절한 시민의식을 알려야 행동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공지를 해야 향후 범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김태준 :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 중에서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윤성 : 아까 제가 답변한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하는 것처럼 시민의식 역시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는 지방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강연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의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영 : 지방정부에서 교육이나 안내 이외에 시설설치의 역할을, 중앙정부에서는 감독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쓰레기 문제의 경우 쓰레기통 부족이라는 원인이 있는 만큼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만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충분히 국민들에게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고지를 한 다음에는 감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법규준수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면 시민의식은 저절로 갖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감시국가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감시, 견제의 역할이 추가로 이뤄져야 합니다. 감독을 명분으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사법부와 입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김태준 : 이때까지 우리는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시민의식을 시민 스스로 함양할 수 있는 의견에 대해 길거리 쓰레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단속과 공모전이라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서 중앙정부는 단속의 역할을 지방정부는 교육, 시설설치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독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1. http://www.youtube.com/watch?v=7dbjk0v1ICs

⑥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경희대학교 제3차 선진화연구모임

류호영(경영):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경제의 고도성장과는 다르게 시민의식 수준은 아직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지난 10 월 30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의식선진화특별위원회의 '박연수' 위원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는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준법 • 배려 • 친절 • 감사 등 그동안 우리가 제쳐놓고 있었거나 잃어버린 덕목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균관대 교육학 양정호 교수님은 "경제가 발전하는 산업화 사회에서는 많이 배워 지식이 축적된 '든 사람'이나 재주가 많아 다방면에서 뛰어난 '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선진사회에선 다른 사람과의 협력, 소통이 중요해 덕망 있고 인간성이 훌륭한 '된 사람'이 부각된다."고 하셨습니다.



'된 사람' 요구하는 선진사회

류호영(경영): 국가를 빛내는 요소 중에는 '경제의 부흥'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이 친절하고 매너 있으며 법과 규범을 얼마나 잘 지킬 때, 그 국가는 빛이 납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측면뿐만이 아니라 시민의식 측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외부에서는 이제 우리를 볼 때에 이제는 '든 국가'와 '난 국가'보다는 **'된 국가'**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국가를 구성하는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선진시민의식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정부나 사회단체 등은 이를 도와야 합니다.

박한승(경영): 맞습니다. 이제는 '된 국민'으로 가득찬 '된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 역사문화와 화려한 강남의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길거리의 쓰레기라던가 교통규범을 어기는 모습과 같은 무질서를 보면 당황한다고 합니다.

류호영(경영):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에게 선진시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대학생 입장에서 소소한 정책제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제도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

이종열(경영): 된 사람을 만드는 교육! 그 교육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개인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사회공간입니다. 이러한 관점과 생각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준다면, 이웃과 함께 사회 속에서 준법정신을 지키고 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성은 어렸을 때 구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가 인성교육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학 입시 때문에 '인성교육'보다는 '지식교육'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덕이나 예절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승택(경영): 맞습니다.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던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도덕교육, 예절교육에 밀접하게 신경을 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회의 커다란 자본이 되는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정부 차원에서 메꾸어주며, 의식교육이 점차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종웅(경영): 그래서 정부는 교육에 힘을 써야 합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철학으로 유명합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단계를 두어 필수적으로 "시민교육" 과목을 가르칩니다. 과목 내용은 주로 인권과 시민의식, 그리고 개인·집단적 책임의식 교육 등 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뒷받침이 되자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시민들은 시민의식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달았고, 스스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덕'과 '윤리' 과목은 주요과목이 아니라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지요. 학생들에게 외면당한 이 과목은,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인식되고 곧 사회 내 도덕의 중요성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다시금 교육제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제도라는 밑거름을 깔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경영): 일단 저는 "기본"이라는 과목을 신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본이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 기본 요소들은 바로 준법정신, 배려정신, 친절, 감사하기, 예의 등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착한 성질이기 때문에 '기본'인 것이지요.

기본을 외우고 익히고 배우면, 또 늘 기본을 실습하고 실험하고, 곧이어 생활화하면, 이것이 곧 체화되고 일반화되어 자연스럽게 사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일명 좋은 사회적 자본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자체 리더들이여, 자랑스럽게 자랑하라!

류호영(경영): 이렇게 모두가 공감하는 선진의식과 그 기본 덕목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전 국민에게 확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유희(경영): 훌륭한 리더 아래는 훌륭한 팔로워가 있기 마련입니다. 리더가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한다면, 이는 아래로 전염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시민의식 소프트웨어가 후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정치인이나 지자체 장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처럼 선진시민의식을 솔선수범하여 갖추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지자체들이 이 발표회에 참석하게끔 법제도화시키는 '지자체 선진화사례 발표회'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지자체 장들이 선진시민의식을 안 갖출레야 안 갖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래로 전염되어 시민들의 선진시민의식 갖추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승택(경영): 그렇겠군요. '전시행정' 문제가 대두되는 와중에, 정치인들이 설마 발표회에서 '일회성 행사', '종이가 더 아까운 캠페인 활동' 등의 세금낭비로 대표되는 전시행정을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떳떳한 시민의식 선진화 성공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선 정말 시민의식을 선진화시키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해야만 하겠군요.

더더욱 좋은 선진화운동을 실천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준다던가, 명예로운 타이틀을 수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이나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달게끔 하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신상필벌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지요.

류호영(경영):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러한 제도가 갖추어진다면, 사회 전체적 분위기나 인프라환경이 선진시민의식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선진사회에서는 '든 국가'나 '난 국가'가 아닌 '된 국가'가 더욱 중요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이므로 국민의 선진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합니다.

토론에서 제시된 선진시민의식 함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여, 이종열 학우가 '기본'이라는 준법정신, 배려, 감사 등과 같은 기본 도덕정신을 가르치는 과목을 신설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자발적인 선진시민의식 갖추어 팔로워인 국민들이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자체 선진화사례 발표회'라는 박유희 학우의 아이디어도 잘 들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대한민국의 사회의식 발전에 대하여 고민을 나누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⑦ 동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제 3차 선진화 연구모임

송동근(동국 호텔 1) : 지금부터 동국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리 전달했다시피 지난 10 월 30 일에는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 성공사례'를 듣는 (재)한국선진화포럼 89 차 월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의식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문턱 바로 앞에서 혼란을 겪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월례토론회의 내용 중 일부를 뽑아 선진화된 대학생의 의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스스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허신양 (동국 경찰 1) : 저는 우선 우리 국민들이 시민의식의 제대로 된 정의를 알고 있는가의 유무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이 무엇인가?'라고 만약 누군가 질문한다면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시민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식이란,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태도 또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데요. 역사적으로는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시민사회를 성립시킨 이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의식이라고 하면, 단순히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부르주아 의식이나 도시주민으로서의 시민의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식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독립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 즉 전근대적인 미망(迷妄)이나 비굴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생활태도를 말하며, 둘째로는 각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입장에서 발언하는 태도, 셋째로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지하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시민의식은 전근대적인 생활을 근대화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 대중사회에 있어서도 긴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시민의식의 제대로 된 정의가 우리의 머리, 가슴 속 안에 남아있다면 자발적으로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연현우 (동국 호텔 1) : 저 또한, 허신양 학우의 말에 동의하는 바가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선, 선진의식의 구체적인 정의를 모두가 안다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의를 아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딱딱한 정의를 알려주고 하라! 라고 시키는 강압적 방법보다 이러한 의식이 자연스레 생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먼저 느낄 수만 있다면 이러한 정의는 비록 모를지라도 충분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시민의식의 구축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도덕과 윤리교과목을 통해 이 내용을 잘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입식, 시험을 위한 암기 교육이 아니라 이런 시민의식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우리 어른들, 우리 대학생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아직 늦지 않았고, 비록 타락한 어른들이 있더라도 선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세상은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고 시민의식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발적 시민의식의 가능성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가치관에 따라 다릅니다.

서연정 (동국 미술 1) : 선진화 된 시민의식은 자발적 동기에 의해 나타난다는 의견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들이 있으며 시티즌 오블리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시켜서, 돈을 줘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 동기에 의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가 강하며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해도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앞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위선적이다. 라고 욕을 먹는 세상이 아닌 그래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했기에 충분히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을 일으키는 방법은 유명한 사람이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군중들도 한 명 한 명 차례로 이어갈 것이며 세상 또한 변할 것입니다.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위해!

양준혁 (동국 영어 2) :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전제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서연정 학우의 말대로 자발적 동기에 의한 시민의식이 가장 올바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발적 동기에 의해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사람의 %수치는 정말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대외활동을 해보고 기업에 다니는 사람을 본 저로서는 자발적 동기가 아닌, 분위기와 무언의 압박이 시민의식을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보았으며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자발적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형태를 보이도록 분위기를 구축시키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말하고 싶습니다.

박서희 (동국 미술 1) : 저는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해보지는 못한 점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우선, 저부터 시민의식을 지켰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분위기, 자발적 동기, 무언의 압박 등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스스로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실천하고 생각한 후에 주변사람들에게 같이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송동근 (동국 호텔 1) : 네. 지금까지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선진국으로 이끄는 방법은 우리들처럼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이 되고 시민의식이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공감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에 우리의 마음 속 안에 다 정리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도덕윤리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토의해보았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열성적으로 토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⑧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제3차 서경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이 개최되었다.

우동식(서경대 경영 4) : 지금부터 서경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시민의식 개선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월례토론회 자료들과 제가 작성한 칼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선진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해 '선진시민의식 가꾸기 운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새마을운동'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제 2 의 도약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인사하기, 미소짓기, 감사하기를 우리 일상 속에서 생활화하여 밝은 사회, 선진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불신과 불안이 팽배해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 학우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황예린(서경대 경영 4) :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하는 행동결과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지속되고 우리의 행동 속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유연한 방법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인혜(서경대 경영 4) : 맞습니다. 포항시의 사례를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감사노트를 통해 자신이 변화하고 주변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예린 학우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지숙(서경대 경영 2) : 그런데 아무런 인센티브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학우님들 의견처럼 강제와 강압도 지속적일 수 없지만 자발적인 참여만을 유도하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진(서경대 경영 4) : 의식의 개선을 위해서 일정부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수준과 정도를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지숙(서경대 경영 2) : 우리 정부를 보면 이미 많은 인센티브, 포상제도가 존재합니다. 쉬운사례로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3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큰 혜택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을 환원해준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적절한 인센티브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보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제, 포상제도가 이미 시행중입니다. 이 제도들을 일정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부분의 지출을 조금만 절약한다면 선진의식 가꾸기 운동을 위한 인센티브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동식(서경대 경영 4) : 무조건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작지만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에코마일리지에도에 가입하여 인센티브를 두 번 받았습니다. 가스, 정기, 수도 요금을 일정 기간 동안 줄여나갈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시 정책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가 맞물려 있으므로 선진시민의식 가꾸기 운동을 비롯한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서경대학교 학생들.

양수진(서경대 경영 1) :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인센티브만을 노리는 사람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가연(서경대 경영 1) : 저는 '선진시민의식 가꾸기 운동'이 내용적인 면과 실행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주(서경대 경영 1) : 저도 '선진시민의식 가꾸기 운동'이 대학생들이나 시민들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기'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인사를 먼저하고 미소를 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각자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말이라도 먼저 상대방에게 칭찬을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커다란 칭찬이 아니더라도 '오늘 얼굴이 좋아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있니?','오늘 기분이 참 좋아 보이는 구나'

이런 말들은 실제로 좋은 일이 없어도 기분을 좋게 하고 정말로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자성의 예언’이라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말인데 ‘칭찬하기’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유민(서경대 경영 1) : 맞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칭찬에 너무들 인색한 것 같습니다. ‘말 한 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마디 말의 가치는 그 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찾아서 칭찬을 해주면, 정말 좋은 점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칭찬하기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동식(서경대 경영 4) :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칭찬하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김형곤(서경대 금융정보공학 1) : 예전에 드라마에서 보았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전 드라마였는데 아침마다 주민들이 나와서 집 앞 마당을 빗자루로 쓸며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 마당을 쓸고 인사를 나누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공동주거단위 별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자선 바자회를 열거나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일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도 보다 원활해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선진화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송소담(서경대 행정 3) : 저도 ‘선진시민의식 가꾸기 운동’이 참 취지도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하기’부분이 참 와닿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일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노트 역시 이러한 맥락과 같다고 생각하며 일기를 작성하며 감사할 일들을 추가로 적어보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선진시민의식 가꾸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겠지요?

정선진(서경대 행정 3) : 사회자 분께서 작성한 칼럼을 보며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송소담 학우처럼 저도 다이어리를 즐겨쓰는 편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고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이어리를 작성하며 감사한 일을 적는 활동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칭찬하기 활동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시민의식 가꾸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민(서경대 금융정보공학 2) : 저도 감사노트 작성하는 활동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기에서 뻗어나간 것이 칭찬하기일 것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우동식(서경대 경영 4) : 많은 학우분들이 '감사하기'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감사노트와 같은 노트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밝은 사회, 선진 사회를 건설하는데 여러분들이 초석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매우 기쁩니다. 노트는 추후에 연락하여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노트 작성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주창한 '선진시민의식 가꾸기 운동'을 지지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방안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참여를 마냥 기다리기보다 약간의 인센티브와 함께 추진하여, 정책을 활성화시키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진의식 가꾸기 운동에 '칭찬하기'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의 활발한 토론도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감사노트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⑨ 선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제 3차 연구모임

이희진(선린대 간호학과): 선진화 연구모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자체 선진 시민의식운동 성공사례에 대한 월례토론회 자료를 바탕으로, 각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지자체에서는 선진시민의식의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윤태웅(동아대 국제관광학과): 부산시에서는 도시 외곽에 있는 죽어가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마을을 꾸미고 가꿔서 관광지로도 사용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로 감천문화마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마을 자체를 꾸며서 상업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행복마을센터'사업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젊은 코디를 선정하여 마을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도록 합니다. 1 년 차가 되면 부산시로부터 지원금이 나와서 공연과 강연을 통해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고, 3 년 차가 되면 행복마을센터를 지어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모이고 카페 등을 운영함으로써 수입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공동체의식도 함양하고 경제적 침체도 극복하여 문화와 관행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서보석(한국해양대 해양공학과): 또 다른 부산시와 자치구청으로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있다면, 부산은 산간지역이라 산과 도로를 끼고 있는 주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마을이란 명목아래 산복도로에 있는 주택가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사업이나 벽화마을 사업 또는 마을 내에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사회적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간 신뢰와 배려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발적인 동기가 생기는 것 입니다.

이희진(선린대 간호학과): 포항에서도 감사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진행된 감사운동이지만 학생인 저는 감사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자체 단위의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인 우리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감나는 운동을 위해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지자체는 지역을 가꾸고 보호 해야 한다.

김국진(동아대 철학과): 지자체 캠페인은 임기마다, 지역마다 그 사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효성을 논하기는 힘들지만 한 예를 들자면 감천문화마을과 삼복도로 주택 사업은 성공한 지자체 사업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 중 하나인 호랑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많고 시민의식함양 즉, 공동체의식을 위한 것 보다 실적을 쌓기 위한 사업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자체의 전통이나 문화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할 때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보석(한국해양대 해양공학과): 저는 질서와 준법과 같은 기본 도덕에 해당하는 부분은 혼자서 갖추기 보다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를 통한 규범과 도덕적 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대학생들에게 실효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홍보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현재 직면한 문제나 필요에 맞지 않는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식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사회에서 도덕적 모범과 규범을 보여준다면 좋을 것 입니다.

이희진(선린대 간호학과): 예,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방문 혹은 거주하셨던 지역에서 느낀 우리나라 선진시민의식의 부족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그리고 선진시민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해 봅시다.

윤태웅(동아대 국제관광학과): 부산은 신도시와 외곽지가 구분이 뚜렷한데, 깔끔하고 정리정돈 된 동네에는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침을 뱉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은 반면 외곽지역은 범죄율도 높고 도시가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깨끗하고 개발된 곳에서는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을 보아, 지자치에서는 균형있게 도시가 발전하도록 해야 하며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을 가꾸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보석(한국해양대 해양공학과): 덧붙여, 같은 사람이라도 조성된 환경에 따라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된 도시에는 50 미터 간격으로 쓰레기 통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의 조경이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어 사람들이 침을 뱉지 않고 쓰레기도 잘 버립니다.

지자치에서 치안에 신경을 쓰거나 환경과 복지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전체적인 도시의 선진시민의식이 올라갈 것입니다. 다만 구역 일일이 지자체에서 간섭하기엔 인적, 물적, 시간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집단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중범죄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이나 범죄율도 여전히 높습니다. 이것을 보면 국민의 도덕성은 상대적인 것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개인의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역할은 이러한 고민의 시작을 돕는 것이고 스스로 개인의 의식을 높이고 행동을 교정해 갈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희진(선린대 간호학과):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자체 성공사례로는 감천마을, 문화마을이 있었고 대전광역시가 이 사업을 선도해 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자체에서는 전체적인 도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단위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소통을 통해 시민의식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⑩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명지대학교 본관에서 이뤄진 제 3차 선진화 연구모임

조아라(명지디미 3) :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명지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화의 문턱에서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은 우리사회를 고통과 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턱을 넘어 '정직', '배려', '준법정신'으로 따뜻하고 살맛나는 선진사회로 갈 수 있을까요?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모두가 공감하는 선진화 덕목을 국민에게 확산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10 월 30 일 89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의 성공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내가 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러 성공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기' 운동을 벌이는 포항시의 사례에 공감을 했는데요. 더 나아가 '감사받기'를 통해서 지자체의 선진시민의식 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선진시민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나 바람직한 역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유진(명지디미 3) : 저는 2 주 전쯤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광명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걷기대회 및 문화축제에 참여했었습니다. 조아라 학우의 봉사활동에 따라가 살펴보니 다른 장애인 관련 행사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참여하는 주체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광명시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좋은 뜻에서 학생들이 참여한 것도 정말 멋진 일이었지만, 광명시에 주재하는 학교들에서 과제로 이 행사에 참여토록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준 확인증을 행사관리 부스에 가져다 주면, 봉사활동 시간도 주고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머니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모자와 손수건, 걷기대회를 위한 옷도 손수 입혀주셨어요. 학생들이 참여하니 자연스레 활기도 띠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통합도 가능해 보였죠.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도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학생들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시절 교실에서 배우는 공부와 더불어 직접 참여하고 동참하는 운동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준식(명지전자공 4) :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주도의 선진시민의식 운동은 어머니회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자체가 지역학교들과 협약을 맺고 이를 이용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는 더불어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지역마다 수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교에서 동아리라던지 학과 행사 등을 지자체의 선진시민의식 운동과 더불어 한다면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지역에 자연스레 관심이 생기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학과에서 종종가는 농활처럼, 지자체에서 하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통합형 행사나 준법의식강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면, 이러한 경험들이 바탕이 돼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한 인재들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이종윤(명지디미 3) : 정말 좋은 홍보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교 축제나 체전 때에도 학내에 작은 부스를 만들어놓고 선진시민운동 참여를 장려하는 브로셔나 기념품을 나눠준다면 학생들의 기억에도 쉽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가 일반시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중장년층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주말을 쪼개 봉사활동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감사하기 운동이나 감사받기 운동과 같이 쉬운 활동이면서, 이를 행동적인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아라 학우께서 나눠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우기’나 ‘승용차요일제’와 같은 선진시민의식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하면 그 인센티브로 스티커를 주고, 그것을 모아 구청에 주면 생필품과 같은 일종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소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선진시민운동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아요.

박유진(명지디미 3) : 인센티브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가 선진시민의식을 약화하는 불법이 주는 이익보다 더 커야 합니다. 인센티브보다 불법을 저질렀을 때 생기는 편익이 더 크다면,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서 나온 학우들의 선진시민의식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방안과 함께 이를 약화시키는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의 강남구 사례와 같이 강력한 지자체의 제재를 통해서 이를 근절하는 것 역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지역학교들이 협약을 맺고 함께하는 선진시민운동

조아라(명지디미 3) :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선진시민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이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학교들과 협약을 맺고 함께 해나가는 방안이 제시되었고요.

더불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여금 중장년층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진시민의식 함양 운동 방안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진시민의식을 해치는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 스스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일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자체가 주도하는 선진시민의식 운동이 없다면, 우리의 시민의식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의견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진(명지디미 3) :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가면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이나 윤리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사회에 나가 일자리를 통해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바라는 현대인에게 이러한 기회를 갖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로 나가기 전, 우리는 온전한 인격체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외활동'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대외활동이 어떤 단체를 홍보하고 스펙을 쌓는 것에서 나아가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외활동을 후원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대외활동기간 중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선진시민의식 함양 운동을 전개한다면 자율적인 시민의식 함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주목하는 사회적 책임이나 공유가치창출과 같은 개념이 대학생의 대외활동에 접목된다면, 훨씬 좋은 취지의 운동들이 많아질 겁니다.

박유진(명지디미 3) : 좋은 생각이네요. 공감합니다. 저는 종교를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미션스쿨이잖아요? 그래서 채플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 삶의 중요가치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눔'이나 '정직', '배려'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러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도 듣고 공감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생활도 바쁜데 시민의식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진 학우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러한 삶에서 종교를 가지고 생활한다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은 선진시민이 될 수 있는 덕목에 대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익광고를 통해 스스로 시민의식 함양을 장려할 수 있을까?

이준식(명지전자공 4) : 저도 학교 교육이 크게 강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민의식은 혼자서 기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모두가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합니다.

최근에는 어렸을 적 보았던 공익광고가 많이 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짧은 영상에 어린 마음에도 깊이 새겨들었던 공익광고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러한 공익광고가 생산적인 활동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죠. 하지만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이 생소해지는 연령층에게는 상당히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덕목을 강조하기에 30 초의 영상은 충분히 시민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종윤(명지디미 3) : 다른 학우들처럼 저도 스스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것임에 공감하는데요. 나눠주신 자료를 살펴보면서 제가 배웠던 상당한 시민의식이 부모님으로부터 형성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우는 시민의식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어릴 적부터 배워와서 그런지 몸에 배어있고 습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모교육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아라(명지디미 3) : 네 열띤 의견과 토론 감사합니다. 모든 학우들이 시민 스스로 함양하는 시민의식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에 바쁜 삶을 사는 우리네에게 그런 시간도,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학생 시절 대외활동을 통해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나눔', '정직', '배려'라는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종교갖기, 공익광고의 활성화, 부모교육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지자체와 선진시민운동에 대한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명지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소박하고 참신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른데요. 선진시민의식으로 만든 건강한 사회가 오늘 우리의 선진화 연구모임 토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상으로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ho9NX_iOWeg

선진화 과제 33:

창조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 74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김민희(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최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가장 이슈가 된 것은 바로 '창조경제' 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 창조경제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큰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논란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창조경제의 개념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창조경제란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 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정립된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시간지체 없이 어떻게 창조경제를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창조 경제를 이루어 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아이디어와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끊임없는 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혹시 창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벤처 창업을 하거나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 도전해본 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 국가의 젊은이들의 벤처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마도 그 나라의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밑거름으로 나중에는 국가 경제를 뒷받침할 사업이 탄생하는 것이고, 어쩌면 미국의 스티브잡스가 그랬듯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에서 창업이란 도전조차 하기 힘든 높은 진입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로는 먼저 정책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금융부문이나 정책적인 부문 등에서 창업을 위한 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청년창업에 도전해보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창업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은 아직 경제능력이 없고 그 때문에 창업을 위한 초기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나 여러 기관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지만,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 지원된다는 원성도 자자합니다. 또한 저리의 창업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창업이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는 이 또한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대폭적인 구조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금융부문에서의 리스크만 줄여준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청년 창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정책적인 요인 말고도 창업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데에는 아주 큰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가치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기업 지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주도하에 성장한 대한민국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이며 흐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 주도의 성장에서는 한계가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저성장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따라잡기 형식의 경제 성장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듦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라는

혁신이 미국 경제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제 사회로 가져왔듯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 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대기업 맹신으로 인해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로 코 앞의 학점관리와 영어 성적만 뒤쫓으며, 대학 졸업시즌에는 여기저기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기업들에 같은 이력서를 넣고, 여러 좌절을 겪는 끝에 취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된 데에는 대기업이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흐름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깊게 고착된 가치관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분위기를 바꾸어 줄만한 전환이 필요하며,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미국에서는 취직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몇 번 실패해 보았는지에 대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실패의 경험들은 그 사람에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험에서 개인의 역량과 도전 정신이 반영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어떠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오히려 취직할 때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패'라는 것을 그 사람의 역량 부족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인들을 보면 모두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러한 노력들이 어느 순간에 결실을 맺어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사회에서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것일까요?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청년들에게 창업이란 도전조차 어려운 '넘사벽'이 될 것이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저성장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창조경제와 비슷한 개념들과 정책들이 이어져 왔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는 젊은이들과 소통하여야 할 것이며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Play Ground 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Play Ground 가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젊은이들의 마인드는 점차 바뀔 것이며, 머지않아 대한민국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도 스티브 잡스와 같은 혁신적인 인재가 나와 전 세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한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지금도 어딘가에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재가 존재할 것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인재들을 발굴해내기 위해 그들을 위한 Play Ground 를 조성해주고 그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② 김상훈(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의 제조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의 부상 때문이다. 철강과 조선은 물론,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바이오 등 차세대 산업에서는 이미

한국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디스플레이와 휴대폰와 같은 첨단기기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을 턱밑까지 쫓아왔다.

값싼 노동력과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던 과거와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급인력 양성, 해외인재 유치로 오늘날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지식산업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3~5 년 내에 중국 제조업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중국뿐만이 아니다. 일본 또한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로 제품 가격에서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불과 1 년 전만 해도 일본을 추월했다고 자축하던 분위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 한국의 제조산업은 서로 중복되는 분야가 50%에 육박한다.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자본을 앞세운 두 국가 사이에서 한국은 또다시 샌드위치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감에 대응하여 올해 2 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를 '창조경제'로 재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바로 ICT 와 융합(hybrid)이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쉽게 실현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도적인 측면만 고려했을 뿐,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요 논의에서 제외된 듯 하다. 바로 '창조 인재'다.

일본의 권위 있는 기관인 노무라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국 유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삼성이지, 한국 기업이 아니다.' 한국 기업은 오랜 기간 카피캣(copycat : 잘 나가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기업을 비하하는 용어)이라는 악명을 얻어왔다.

지금까지 한국기업이 시장 선도자(first mover)가 아닌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벤처 활성화를 위한 창조 생태계 조성을 논하기 전에,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창조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조 인재가 없는 이유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 때문이다.

한국의 교육은 이미 정해져 있는 '진리'를 학생에게 무작정 암기하도록 강요한다. 문학의 시 한 편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시 문구가 있을 경우 개인이 생각하는 느낌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은 '공감각적 표현'이라는 진리를 무조건 외워야 한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각이 표현되고, 서로 부딪히고, 비판하고, 반박되는 과정에서 한층 더 높은 지적(知的) 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교육 시스템은 개인의 고민이나 표현, 반박이 표현될 여지도 없이 학생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진리를 암기토록 종용한다. 개인의 사고가 오직 내부에서만 맴도는 데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창조 인재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관련하여 하나 거론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 바로 신자유주의 학파의 중심이자 80 여 명에 달하는 노벨상 수상자로 명성이 높은 미국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 대학교(The University of Chicago)다.

지금이야 세계에서 알아주는 명문대학이지만 설립된 1890 년부터 1929 년 때까지만 해도 둔재만 가는 소문난 삼류학교였다.

하지만 1929 년을 기점으로 100 권의 인문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시카고 플랜 프로그램'이 개설되면서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를 최다 배출한 명문대학으로 도약했다. 이는 이론 모델(theoretical model)을 자유로이 만들 수 있는 틀에서 벗어난 사고 덕분에 가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대학은 이미 진리가 상정된 특정 학파가 학계를 지배한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은 찾아보기 힘들고 논문 또한 짜깁기를 통해 심사를 통과하기에 바쁘다.

학생들 또한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기업 인적성검사 공부나 보기 좋은 스펙 쌓기, 입에 발린 면접 답변을 연마하기에 급급할 뿐 남들과 달라질 생각은 하지 않는다.

창조인재 육성의 핵심 방안은 커리큘럼을 포함한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다.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줘야지, 단순히 암기하는 기계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토론식 수업과 독서 교육, 논술형 시험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특수 학교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출범되어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국제학교는 그 의도와는 반대로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단순히 엘리트 코스의 과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학교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그에 맞게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한다. 미래 전략 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 학교 설립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위에서도 거론했듯이 창조 경제의 핵심은 ICT 와 융합이다. 하지만 ICT 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 대학에 진학해서야 ICT 분야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ICT, 그리고 일찌감치 전략 산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신문과 뉴스에는 연일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 유수의 기관과 전문가들 또한 한국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약 10 년 전 겪은 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듯이 이번 위기 또한 반대로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지식 경제로 접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가 부도를 앞에 두고도 국민들의 숭고한 단결과 의지로 꿋꿋이 위기를 극복하고 G20 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이번에 짙어진 위기 또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창조 경제를 움직이기 위한 창조인재의 육성이다.

③ 김소은(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바야흐로 창조경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창조경제가 나오기까지의 배경에는 기존성장동력의 약화, 그로 인한 청년 일자리 부족 그리고 양극화 현상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들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이나 추종자에서 선도자로의 전환을 꾀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정책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나온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론의 기본 개념은 개인의 창의성입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켜 한편으로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창조적인 인적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창의력의 발현을 막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 세기에 필요한 창의성을 갖춘 인재는 거미형 인재라고 불립니다. 거미형 인재는 개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미래상을 그리며, 거미줄로 먹이를 기다리는 선제적인 스타일입니다. 과거에는 근면성실하고 조직 내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개인의 개성, 창의성보다는 조직의 틀에 맞출 수 있는 개미형 인재가 주류였지만, 이제는 거미형 인재의 필요성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미형 인재의 육성을 통해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미형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거미형 인재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교육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쳐,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교육은 개미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맞추어진 교육이었습니다. 주어진 지식을 암기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 생각하기 보다는 기존에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도록 교육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미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거의 개미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는 거미형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습니다. 시대가 변화했지만 여전히 지금의 교육은 시험을 보기 위한 암기과목이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생각하거나, 그 새로운 생각을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입시제도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 한은 지금의 교육방식을 바꾸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입시교육 외에 따로 창의력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창의력 교육은 구체적으로 창의력 훈련을 시키는 것이던지, 창의력 자체에 대한 교육도 좋겠지만 가장 쉽게 창의력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한 해 동안 전교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운영했고 그 이듬해 외부기관을 통해 활동 전과 활동 후의 창의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저학년은 유창성이 19.87 점, 독창성이 9.8 점 상승했고, 고학년은 유창성 9.43 점, 독창성이 3.06 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인 지난 해 4 월에 대비해 창의적 요소에서는 사고의 확장 24.8%, 사고의 수렴 19.8%, 문제 해결력 23.8%, 개방성 12.5%, 독립성 12.2%, 호기심/흥미 21.4%가 증가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외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 만으로도 창의력 향상에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미형 인재를 얼마나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가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창의력 교육만이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을 변화시키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④ 김유나(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한강의 기적’ 50 년대 최빈민국에서 단 30-40 년 만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강대국으로 큰 도약을 한 우리나라 경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00 년 들어서 성장모델 전환을 위해 ‘지식기반경제’, ‘혁진주도형 경제’,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전환경제’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내걸었지만 이전 정부의 경제모델은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또한 지금 막 시작하려는 입장에서 논의는 충분히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념들이 잡혀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도 해외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해답은 창조경제론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력해야 하는 방면과 정책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정부들의 모델과 같이 구체적으로 경제분야의 주도적 참여와 인재육성을 하지 않으면서 창조경제를 추진해나간다면 전례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하리라 봅니다.

〈창조경제〉를 현정권 5 년의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 프로젝트로 보고 현정부에서는 물론 다음 정부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조국가가 되기 위한 발판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를 창조국가로 만들기 위해선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는 바로 벤처캐피탈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벤처캐피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주변 대학생들에게 “벤처캐피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알고있다는 대답을 한 학생은 매우 적었습니다. 또한 알고있어도 그 개념에 대해서 성공한 벤처기업들에게 더욱 많은 투자를 하여 많은 이익을 얻는 형태로 알고 있거나 성장에 있어 상승세를 보이는 벤처기업들에게만 투자하는 회사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벤처캐피탈의 본래의 의미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주목받지 못하는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주식투자의 형태로 투자해 그 벤처기업이 성장에 상승세를 보이면 지분을 매각해 원금을 회수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벤처캐피탈들이 많아져야 벤처시장에 자금규모가 커지고 벤처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받은 자본력으로 고급인력, 우수한 기술, 외국자본 등을 대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의 성공적인 활용사례로 대표적인 나라가 두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에서는 투자를 한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실패했을 경우 재도전의 기회도 준다고 하는데요.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들의 활성화를 통해 얻은 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이죠. 실리콘밸리 벤처시장의 비결은 바로 벤처캐피탈에서 창의적인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한 다음 CEO 와 매일 최소한 20-30 분씩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전화나 이메일로 논의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경영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경영에 참여하여 시기적인 문제로 실패했을 경우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큰 벤처캐피탈 시장인 만큼 국가에서 '요즈마 (YOZMA)펀드'라는 모태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60 을 투자하고 나머지 40 프로를 민간 벤처캐피탈에서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창업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벤처시장활성화를 요구하면서도 벤처캐피탈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것은 물론 벤처시장의 자금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벤처캐피탈들도 위험도가 크다 보니 이익을 얻기에 급급하여 이미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세를 타고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투자가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공벤처캐피탈들이 활성화되어야 위험도가 줄어들어 벤처캐피탈 시장이 커질텐데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 공공벤처캐피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는 것은 '종합기술금융' 한군데 밖에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같이 벤처캐피탈들이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CEO 들은 오히려 벤처캐피탈이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벤처시장입니다.

이렇게 벤처캐피탈 시장이 작다 보니 벤처기업, 창조시장의 자금규모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고급인력들은 벤처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은 자본이 없어 창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중입니다.

창조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을 많이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 자본을 줄 수 있는 게 벤처캐피탈입니다. 벤처캐피탈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는 아직 벤처캐피탈 회사 자체가 몇 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 벤처캐피탈의 수를 늘려서 벤처시장의 위험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민간벤처캐피탈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양성하여 자본을 키워야할 필요가 있는 데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우리나라만의 벤처캐피탈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실리콘밸리와 같이 cluster 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와의 차이점은 바로 벤처캐피탈 cluster 라는 점입니다. 벤처캐피탈들도 이제 막 시작하면 위험도가 클 것입니다. 그런 벤처캐피탈들을 묶어서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함께 벤처기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도를 낮추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 cluster 를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형 실리콘밸리를 벤처캐피탈 cluster 를 통해 만드는 것입니다. 벤처캐피탈 cluster 가 성공한다면 저절로 벤처기업들이 몰려들고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창의적인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가 커야 합니다. 이 자금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처럼 벤처캐피탈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벤처캐피탈을 많이 만들어 벤처시장의 위험도를 낮춘 다음 우리만의 방식인 벤처캐피탈 cluster 를 만들어 벤처캐피탈들이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동반성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모가 큰 벤처캐피탈들이 많아지면 더욱 많은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것이고 벤처시장 자체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⑤ 김한얼(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박근혜 정부가 제 2 의 경제부흥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 핵심 키워드로 '창조경제'를 천명한 지 세 달이 지난 지금, 다소 애매모호했던 창조경제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워낙 거시적이고 광의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국정 초반부터 그 개념의 정립에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전문가들의 구체화 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Outline 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체화된 창조경제의 개념을 종합해본다면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며, 궁극적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자 국정 철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언론에서 수차례 밝힌 바대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큰 축은 바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입니다.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지식·정보(Contents), 융합(Convergence), 개인의 창의성(Creativity)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신성장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큰 분야가 바로 ICT 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로 떠오른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과 ICT 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비전 실현을 위한 5 대 전략(▲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SW(소프트웨어)·콘텐츠의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함께 업무보고를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갈등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소관 업무의 애매한 교통정리로 논란의 불씨를 남겼던 미래부와 방통위는 출범과 함께 약속이나 한 듯이 '부처 간 협업'을 다짐했으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향후 정책 혼선에 따른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주파수 정책과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미묘한 알력을 형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과 관련해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700MHz 대역 중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68MHz 폭에 대해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방송용 주파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방송·통신 분야를 관장해왔기 때문에 700MHz 는 여전히 방송용이며, 방송용 주파수는 여전히 방통위의 소관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부도 해당 주파수 확보 의지를 피력하면서 올 연말까지 16Hz 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을 수립할 것이라고 대응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놓고도 양 부처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 일 취임 직후 “단말기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반면, 미래부는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 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방통위의 기능 일부가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지상파 재송신, 주파수 재분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등 관할이 겹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공무원들과 사업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복과 충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양 부처가 이례적으로 정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두 부처가 전격적으로 공조체계를 구축했지만, 앞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초, 한 부처에서 관할해야 할 일을 비정상적으로 분할함으로써 발생하는 난제들을 해소하는데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 월,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면서 방송용으로 쓰던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쓰겠다고 벌써부터 뜨거운 로비전을 벌이고 있는 이통 3 사, 근절되지 않는 불법보조금 대책, 지상파 재송신문제 등 ICT 관련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지금, 창조경제의 쌍두마차 역할을 수행해야 할 미래부와 방통위 사이에 끊임없이 잡음이 들리면서 창조경제의 앞날에 제동이 걸린 형국입니다. 행정학자와 ICT 전문가들은 자칫 미래부와 방통위 간 갈등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경우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부처는 주파수 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지상파방송 재송신 등 산적한 현안들을 긴밀한 공조와 업무의 효율적 분배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전파·주파수, 뉴미디어는 물론이고 통신, 방송 관련 업무 전반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간의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파행과 혼선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조경제의 실현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고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한 과제입니다. ICT 를 통한 창조경제의 달성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정보통신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밥그릇 싸움에 치중해야 될 때가 아니라 부처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토대로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⑥ 백유민(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한국의 발전이 정체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 수준에서 새롭게 천명한 창조경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적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정부가 창의성 주도 경제 확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 분야를 비롯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의 재산권’으로 과거에는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무형의 창작물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권리를 지칭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4 월 26 일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로,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 지적소유권기구(WIPO)에서 지정한 날이다.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는 지적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를 위해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발전이 그 전제가 될

것이다. 창의성을 보장해주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한다면 사람들은 더더욱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도 지적재산권 보호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례로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전쟁이 벌어졌던 것처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갈 길은 멀다. 세계의 다른 여러 국가와 비교해보았을 때도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창작물을 불법다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세계적 수준에서 보호되어야 할 지적재산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무역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갈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보호무역의 움직임으로도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국내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외국의 기술을 빌려오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치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적재산권 취급에 대한 정책적 수단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이다. 지적재산권이 보장되어야 원천기술의 개발도 더 활발해질 수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민간 차원의 인식전환도 함께 요구되는 만큼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⑦ 송경림(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품고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과학기술과 ICT 를 통한 창조경제를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상-도전-창업의 국민운동과 융합형 과학인재 육성, ICT 전문인력 양성을 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역량 강화와 지원을 통해 창업으로 이어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필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이러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국정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 스티브잡스 같은 창의적인 인재가 있을까? 필자는 당연히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스티브잡스와 같은 창의적 인재를 발굴해서 키우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일단, 우리 대학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대학은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기관이라기 보단 최고의 샐러리맨을 발굴하는 기관인 것 같다. 시험기간에 대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대기업을 위한 학점을 위해 전공서적을 암기하고 또 암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끔은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의 연장선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대학에 오면 더 창의적인 수업방식과 내 의견을 발표하고 내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교육을 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막상 대학에서는 학점을 얻기 위해 다른 친구들과 경쟁하며 암기식의

공부를 시키고 있다. 왜 우리는 모두 대학에 들어와 대기업에 입사하는 최고의 샐러리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실제로 필자가 아는 분은 서울에 있는 S 대 경영학과를 자퇴하고 창업으로 성공한 분이 계신다. 그 분은 19 살 때 창업을 시작하셨고 대학 경영학과 공부가 실질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업이라고 느껴져 시간이 아까워서 2 학년 도중에 자퇴를 하셨다는 말을 들었었다. 현재 나와 2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사장님에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기업만 가려고 스펙을 쌓는 것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다. 사장님은 대학생들이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대기업을 가고자 하고 스펙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

또, 실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없어서 창업을 시작조차 못해보는 친구들이 많은 것이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말하셨다. 필자 역시 대학의 분위기와 사회의 분위기가 우리 학생들을 리더가 아닌 최고의 셀러리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대학의 분위기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샐러리맨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모두들 같은 스펙을 쌓고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며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에 도전하기를 꺼려하는 대학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창업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게 된다. 하지만 창업 실패시의 실패 자체뿐 아니라 융자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미국의 경우, 사업에 있어 실패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2 번 이상의 실패는 박수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패 경험은 최악의 경험이며 한번 실패는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된다. 실패를 하면 용기 낸 도전자의 인생에는 빚만 남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대학생들에게 창업 도전에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는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해왔던 새로운 경제 정책처럼 5 년 뒤 말 없이 살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과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 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지만 5 년이 지난 지금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는 말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창조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첫째로 대학 내의 분위기를 단번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처럼 모든 것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대답해주는 수업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육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교양수업을 시작으로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수업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의 학교에도 창의성과 관련된 수업들이 여럿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창의성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평가로 이를 평가 받는다. 창의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받는 것이 가능할까? 필자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학은 이미 학점을 상대평가로 퍼센테이지로 정확히 나누어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 역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이 아닌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수업을 선택한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늘릴 수 있는 수업과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사회의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필자 또한 창업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에 가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필자를 비롯한 대학생은 스스로도 자신이 샐러리맨이 되기를 원하는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보고 단순히 대기업을 가기 위한 발판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대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그래서시간이 지나 몇 년 후에는 대기업에 가고 싶다가 아니라 요즘 누가 대기업에 가느냐? 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창업 붐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창업 교육을 정부에서 투자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창업 교육은 보여주기 식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를 위해서는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형태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일시적인 교육이 아닌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금융권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창업을 하는 대학생을 하는 융자의 이자가 낮다고 하더라도 창업 실패 시의 융자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다. 또한, 담보가 없는 대학생은 창업의 자금이 없어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창업에 가장 큰 장벽은 자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권에서는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보 삼아 융자를 해주는 형태가 필요하다.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면 은행 자체에서 투자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성공했지만 우리나라의 송도가 실패한 이유는 엔젤 투자자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업이 창의적이라고 생각되면 바로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들이 많고 전문적으로 양성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는 블랙엔젤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잡아 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투자자들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에도 엔젤투자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습적으로 엔젤 투자자들이 대물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엔젤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면 좋은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⑧ 이윤정(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김병도 서울대 경영대학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기업형 창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부 창출 효과가 큰 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이려면 최고의 인재가 창업해야 하고 체계화된 창업교육을 통해 이들이 철저하게 창업을 준비토록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창조경제, 이는 참으로 모호한 단어이다. 기존의 선진국에 의존해 따라가던 산업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창의성으로 기존의 것과 IT 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본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정책의 방향 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폭넓은 대안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창조경제의 핵심 역량은 창의적인 인재 발굴에 있다고 본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도 결국은 핵심적 인재가 있어야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이에 대한 것으로는 교육이 있다. 인재를 기르는 것이므로 교육이 우선시 될 것이다. 이를 창조교육이라고 하는데, 창조교육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는 다르다. 기존의 교육이 시험 위주의

암기이고 지식 테스트에 불과하다. 독일의 빌레펠트 대학의 오토 석좌교수는 “한국의 교육은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객관식 시험이 존재하지 않나. 이는 스스로 쌓아가는 교육의 방식이 아니다. 지식 중심의 교육은 모방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였다.

스스로 돌이켜 보아도 우리가 배운 공부 중에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시험점수를 잘 받기 위해 급급하게 일 이주 바짝 공부해서 시험치는 것이 대학 공부의 현실이다. 이는 고등학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대학이라면 더 넓은 범위에서 사고하고 학습의 깊이도 깊어져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창조교육은 기존 교육의 틀을 바꾸어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창조적 인재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실천 방안으로는 그룹 문화를 양성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의견을 말하면서 이를 조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있다. 개인을 중시하던 교육에서 벗어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본래 의견에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반복하면서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경쟁이 완화된 교육방식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경쟁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생각의 폭은 좁아지게 된다. 다양한 사고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정답만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당장은 기존 입시경쟁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없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과도한 경쟁은 자제시켜야 한다. 이대로라면 24 시간 중에 20 시간 이상을 공부에 투자해도 5 시간 공부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공부의 양보다는 질이 우선인 교육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공부 스타일이 변한다 해도 기존의 암기위주의 교육이 통하는 사회질서가 유지되어 있다면 우리 사회의 교육은 평생 제자리 걸음일 것이다. 정부는 큰 틀을 잡고 교육의 방향을 잡아주어야 하고 이를 잘 따라오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정부가 잡아야 하는 큰 틀은 중. 고등학교를 잇는 대학 입시 경쟁을 일정부분이라도 완화시키는 정책적 방향을 의미한다. 독일의 빌레펠트 대학교는 재수, 삼수를 할 필요가 없다. 순서를 기다리면 원하는 곳에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 싫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야 하고 인기 있는 과는 그만큼 경쟁률이 높으므로 본인의 노력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자신이 공부를 하지 않은 만큼 대기시간은 무한정 길어지게 되므로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학 어느 곳이든 돈을 들이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다. 이들은 독일의 기본법에 따라서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면 수시와 정시 서류 접수하는 데도 오 만원에서 십 만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 학교에 시험을 치러 가기 위한 교통비와 식비, 그 외의 비용을 전부 합하면 금액이 불어나게 된다. 여기서 한 군데의 대학에 서류를 넣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의 수에 따라 곱해지면 입학 전에 큰 돈이 요구되어 등록금을 내는 것이 어려워진다. 높은 등록금과 대학을 가기 위한 각종 비용이 배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하나씩 지워 나아가야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초, 중, 고등학교 때는 기초를 다졌다면 대학은 이를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벌판인데 이를 막는 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는가.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변화시킨다고 하여도 국민들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스스로가 새로운 교육 방식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을 해본 스스로가 생각해보자. 기존의 교육방식을 통해 과연 얼마나 내가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뚜렷한 주관과 정보를 거르는 능력이 부족하다. 배우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를 믿는다.

이제는 옛날과 다르다.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창의성이 중요시 되고 그것이 즉 앞으로의 취업이나 산업분야 등에서 점점 더 우리의 삶과 연관성이 깊어질 것이다. 그 속에서 벗어나 크게 생각하고 여러 생각을 융합하고 색다른 사고를 해야 한다. 내 자신의 스스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사회 속에서의 삶을 위해 창의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⑨ 전아영(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이번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희망찬 포부를 밝혔었다. 이를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미래창조과학부' 가 출범하였다. 앞으로는 창조경제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확인하는 일만 남은 상황이다. 또한 국민들은 이제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논의하는 데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민 참여와 각 부처 간 소통의 창구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제"를 일컫는다. 글로벌 경제위기,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 고령화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심각한 상황들 속에서, 창조경제의 존재가 절대적이라 말하는 국민들은 창조경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동시에 창조경제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또한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을 거라는 선입견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정부에서 확실히 제시하고 이행하여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은 선진국의 사례를 모방하고 학습하도록 권장하면서 이와 동시에 창의성과 노력을 겸비해 무언가의 "최초(=창의성을 지향하라!)"가 되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모순적인 모습 말이다.

창조경제의 핵심개념은 "창의성"이다. 그리고 이런 창의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로, **청년창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청년창업의 경우만 해도, 도전하는 젊은 혈기를 객기로 치부해버리는 우리나라의 사회와 학창시절 내내 개성의 존중보다는 틀에 박힌 교육만을 주입받아온 우리들에게 어쩌면 창조경제는 너무나도 모호하고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일자리가 늘지 않아 고용률은 정체되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한 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의 부족으로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으나, 이런 청년들의 살길로 창업을 독려하는 분위기도 아닌 우리 사회의 양면적 모습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험을 감수하고 창의와 혁신을 시도하는 젊은이들의 기업가정신이 피기도 전에 시들고 있다. 지난해

창업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의향이 있는 대학생들은 63.3%에 달했다. 하지만 창업 의향이 있는 이들 대학생 중, “바로 창업하겠다.”고 대답한 학생은 3.6%에 불과했다. “취업해 사회 경험을 쌓은 뒤 창업하겠다.”는 답이 83.1%나 차지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취업’ 에 손을 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우수한 인재가 의사, 변호사, 검사,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대기업 등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깔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창업 강국"은 먼 나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해결법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같은 근본적 차원의 개선안 밖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뤄지기엔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창시절 내내,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아 완벽하게 수능을 치르고 높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강요받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문화가 깊이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부모 입김이 무척 세다 보니 창업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 못 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무조건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누구보다도 성공해야 인정받는 사회이므로, 젊은이들은 자연스레 안정성을 추구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갖추게 된다. 이 때문에 소위 ‘돈 되는’ 아이템에만 창업 희망자가 몰려 비슷비슷한 창업 아이템들만 쏟아지기도 한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손쉬운 창업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장이 확실한 미래만 쫓는 보편적인 사회의 인식을 바꾸려면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창업 활성화 정책이 진행되고, 기업가정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사회의 모습을 대변하듯, 국민들은 미흡해 보이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시도나 노력을 이해하고 맡겨볼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에 큰 열망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특히 젊은 우리들은 실패가 “실패”가 아닌, 최종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하나의 단계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의 조성을 꿈꾼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자신의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펴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너그러운 사회를 바란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아져 국민 모두가 하하호호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이 모든 것들의 실현은, 정부가 창조경제의 직접적인 선수(Player)가 되기보다는 공정경쟁이 가능한 환경과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것에 그 시작을 둘 수 있겠다. 창조경제를 총괄하는 부서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 개개인의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발현시켜주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자산을 활용하여 창업과 일자리 증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곳곳에 숨어 있는 장애요인을 관계부처가 함께 해결해 나가고, **국민의 희망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대국민 창구 역할** 역시 담당해야 한다.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성공 여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밝혀지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참여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성공의 가능성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도 중요한 성공요소가 된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함께, 이제까진 볼 수 없었던 경제의 새 역사가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전아영: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74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창조경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의 문제점들의 개선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진국의 사례를 모방하고 학습하도록 권장하면서 이와 동시에 창의성과 노력을 겸비해 무언가의 “최초”가 되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모순적인 우리사회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김한용 학우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용: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중에서도 1 순위입니다. 이는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통섭학문들과 조화를 이루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연결되어, 저는 취업과 경제 관련에서는 상관없는 학문들인 문학 · 철학 · 사학도 들의 전문적 지식을 기존의 경제에 대입시켜 비인기학과라는 개념을 타파하고, 기피되는 인문학의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 “아바타”를 들 수 있는데, 폭발적인 흥행을 이루었던 이 영화 속의 나비족의 언어는 영문학자들과 각종 고대 언어학자들이 3D 영화산업에 뛰어든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그 언어를 창조해내서 영화의 기초를 보다 더 튼튼히 하는데 이바지 하였습니다. 첨단기술이 기반인 사업에 순수인문학자들이 참여한 대표적인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문화예술계에만 국한되어있는 예를 든 것 같은데, 새로운 건축물이나 디자인이 만들어지는데도 단지 산업디자인이나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고미술사학과나 동양사학 전공자들이 가진 인문학적 지식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더 경쟁력 있는 설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아영: 색다른 생각이네요. 아바타의 나비족 언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김한용 학우는 “융합”에 창조경제의 초점을 두었군요. 그럼 다른 학우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김이환: 일단 제 생각에 창조경제라는 것이 슬로건은 멋있지만 실제로는 과거 정부들이 추진해온 IT 산업 육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게다가 창조경제라는 것이 결국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건데, 현재 한국 산업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과는 달리 기초과학과 제도가 불안정하고 규제가 많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튼튼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치 예전 한강의 기적처럼 무조건 시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기초과학과 인문학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결과를 요구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기초기반을 다져야 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아영: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모순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이환: 과거 우리나라가 발전해올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선진국들의 다양한 경제모델을 들고 와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중진국과 선진국 사이에 있는, 혹은 선진국이라 불리는 오늘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서 최초가 되어서 특허 따위를 선점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나라에서 더 잘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는 모방과 최초를 동시에 강요하는 모순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나 기술, 산업 따위가 지금 무척 딜레마에 빠져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순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침체될 테고요. 그래서 저는 최초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 보다, 최초가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어떤 학문의 응용이나 융합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초와 기반을 먼저 다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아영: 이해되는 모순이라... 사실 저도 이 말에 무척 공감이 가네요. 그럼 김동욱 학우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창조경제의 문제점은 우선 “인내심의 부족”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론이나 관료진들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관료들의 플랜에도 실현가능성이 빠른 걸 선호하죠. 하지만 경제라는 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불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 없이 경제를 바라보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편견”입니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은 김종훈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훈 씨를 미국의 첩자라고 각종 여론이 몰고 가자 결국은 낙마하고 말았죠.

그의 능력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김종훈 씨가 미국 시민권자고, CIA 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 완전 죽일 놈으로 몰고 간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김종훈 씨는 마녀사냥의 희생물이 되고 만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정부가 앞으로 일궈내야 할 창조경제는, 기존의 국내파 관료들이 아닌 외국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 관료들을 전면에 세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아영: 김종훈 씨 사건은 한 때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죠. 저도 김동욱 학우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방과 최초의 동시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욱: 저는 선진국의 성공 사례 모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좋은 점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만의 새로운 방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이라고 평가받는 것의 대부분은 그 기초가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냉정히 경쟁하는 시대에서 우리만의 선구자적 분야가 생긴다면 좋은 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을 긍정적인 결과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아영: 그렇죠. 성공한 나라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우리만의 특색 있는 방식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분야에서의 최초는 바로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조수정 학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정: 제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란, 선진국이 어떤 것을 창조해내고 그것들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모방사례를 기반으로 한다 생각합니다. 창조를 위해서 먼저는 모방이 필요한 것이죠. 모방을 기준으로 더 멋진 창조물이 나오는 예술의 세계의 논리와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시대별로 충분조건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현 선진국을 따라가되,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찾아갈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하겠죠. 현재 선진국들도 새로운 것을 세척하고, 스스로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현재 그들의 위치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이나 일본을 무작정 따라 하기만 했다면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선진화가 되기 위해, 모방과 창조의 비율을 적절하게 키워 나간다면 올바른 선진문화에 대한 정의도 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아영: 적절한 비율의 조합이라... 굉장히 현실적인 답인 것 같네요. 조수정 학우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수정: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를 이야기할 만한 경제적인 위치에 있냐부터 논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를 해낼 수 있을만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하구요. 넓은 의미도 좋지만, 경제민주화처럼 허울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 코앞에 보이는 것만 추진해나가는 우리나라 기업들 혹은 국가정책들로는 절대 창의적인 경제정책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창의보다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의논해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아영: 바로 다음 학우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은: 저는 가장 먼저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IT 분야의 전문육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편향적인 교육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뇌 발달이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될 거예요. 다양한 교육을 통한 인재 특성화 교육이 중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고급화 같이 그 기업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 시켜주는 쪽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는 곧, 중소기업의 질과 역량을 높여주는 것이니까요. “최초” 에 대해서는, 전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한번 참고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안을 찾고 또 다른 최초가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모순적이라 말할 순 없다는 거죠. 타산지석의 자세로 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전아영: 맞아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바로 “타산지석”! 이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 안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백상민 학우의 의견은요?

백상민: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자본주의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생태계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 발전기에 낙수효과를 위시한, 소위 대기업 발전 전략은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데 이바지했으나, 현재는 오히려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면에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창조경제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낸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균형 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태계 내에서 포식자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그 균형이 무너지는 것처럼, 국가 경제 역시 대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주도하는 대다수의 대기업들과 낙수효과를 기대한 대기업 위주의 성장위주 정책은 결과적으로 건강한 자본주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한 다음에, 창조적인 경제 환경 구축을 해나가야 합니다.

전아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창조경제 실현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모순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상민: 최초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최초에 앞서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분별한 일등 지상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노력합니다. 최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를 위해 몇 년이라는 세월을 선수촌 내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노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선수 육성 정책은 국제 경기에서 우승할 경우, 해당 선수의 이미지는 물론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수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최초, 혹은 최고가 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는 달리 나머지 사람들은 경쟁 구도 내에서 도태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를 위한 경쟁은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경쟁에 적응하지 못해 합류하지 못한 이들은 그만큼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초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아영: 그렇죠, 우리사회는 패자부활전에 대해 너무나도 인색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두려움 때문에, 젊은 혈기의 청년들도 마음 놓고 창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새내기 수정이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까요?



전수정: 창조경제란, 창의력 · 상상력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새 시장을 만들고,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는 논리적 사고 → 창의적 사고 → 융합적 사고 → 발명적 사고의 패러다임을 거쳐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우선, 창조의 주체가 정부인지, 기업인지, 아니면 국민인지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체가 기업이던, 국민이던 애초에 창조경제라는 것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본래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경제란,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 되어야만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기업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막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창조경제는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뿐더러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실효성 없는 표어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전아영: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모토는 순서별로 정리해 주었네요. 변화과정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 창조경제에 대해 이해하기가 한결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수정 학우의 마지막 발언은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간결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생각이니 뭐라고 말을 덧붙이진 않겠습니다만, 요즘 20 살의 생각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 새롭군요. 그렇다면 유주혁 학우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유주혁: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생성되고 자유롭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가장 쉬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정부의 과도한 기업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조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기업, 벤처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아영: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의 실현화는 그 경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을 겁니다.

유주혁: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천은 선진국의 일류기술을 모방 · 습득해 온 모방 기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성장 경제로의 완전한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천기술을

먼저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응용과학으로 파급될 역량이 생기기 것과 마찬가지인거죠. 우리나라의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표준기술의 선점과 신기술의 산업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확보한 뒤, 모방기술경제에서 기술혁신주도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아영: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창조경제에 대해 잘 말씀해주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욱 학우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허창수 창조경제특위원장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창의력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시장은 창의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 창의적 인재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말은 현재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층에게는 희망적일 순 있지만, 창의력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하나의 스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봉사활동을 하나의 스펙으로 전락시킨 것처럼 말이죠. ‘창의력’이라는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때입니다.

전아영: 진심에서 우러나와 해야 하는 봉사활동마저도 스펙의 일부의 분류되는 요즘 사회가 참으로 각박한 것 같습니다. 또한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 없이 뒤돌아버리는 요즘 현대인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이상욱: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창조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추진방안으로 창업을 위한 창조 시장 활성화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 경제는 대기업의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신생 기업들의 활발한 창업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국내에는 벤처기업이 크게 성공을 거둬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기술을 자산으로 시작한 벤처기업들이 성장하기에, 대한민국은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아영: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개성방안이긴 하나, 막상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셨네요. 이상욱 학우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9 명의 학우 분들과 함께 창조경제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참으로 유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모두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창조경제의 모습이 달랐다는 점이 참으로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②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유나: 안녕하세요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창조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월례토론회 주제를 통해 창조경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 창조경제 중에서도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를 통해서 창조경제 생태계라는 단어를 보셨을 텐데 첫 번째 주제는 창조경제 생태계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짧게 설명드리자면 중소기업활성화와 벤처캐피탈의 중요성, 창의적 인재 양성 등 주요한 이 세가지를 통해서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한

다음 창조경제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바탕을 탄생한 단어입니다. 이 세가지 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다면 토론할 때 언제든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주제는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입니다.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지 각자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조경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민연: R&D 비중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이 풍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재정이 풍부해야 창의적인 기술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많이 들여와 재정이 풍부해지면 R&D 분야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영화: 창의적인 인재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을 투자해서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하는데 인적자원을 늘릴 때 창의적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준: 창조경제가 나오게 된 계기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온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인 체계화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의 문화와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영: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창조적인 산업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예: 저 또한 중소기업활성화와 벤처기업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입니다. 대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이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한 적이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해요. 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연: 지금도 법적으로 인적자원 빼돌리는 것 등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월급이 짜다고 해요. 중소기업의 월급이 대기업만큼의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영화: 중소기업도 대기업만큼의 사원 복지가 이루어져야 중소기업에 인재가 많이 지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절로 중소기업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복: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안가는 이유가 연봉보다는 영화학우가 얘기한 복지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게 복지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좀 벅찬 것 같으므로 중소기업 사원 자녀의 학자금지원 등과 같은 복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유나: 네 지금까지 창조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활성화와 인재육성, 벤처캐피탈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왜 중요한지와 어떻게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이어진 것 같아 다들 창조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활성화 외에도 저는 칼럼을 통해서 벤처캐피탈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했는데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준: 민간에서 하면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산업이나 이미 자리잡은 산업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는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찬복: 국가가 무조건 초기단계의 기업을 도와주다 보면 민간의 벤처캐피탈은 당연히 초기단계의 벤처캐피탈에게 투자하는 자본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부담하는 위험도가 커지게 됩니다.

국가가 위험도를 떠안고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공벤처캐피탈이라고 해도 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인데 손실이 크고 위험부담이 큰 초기단계에 무조건 국가가 먼저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준: 벤처기업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지수화를 만들어서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좀 더 창의적이고 우수한 벤처기업의 사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찬복: 국가차원의 위험부담을 줄이려면 국가차원의 벤처캐피탈에서는 성장기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게는 민간투자나 대기업에게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지예: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민간벤처캐피탈은 위험도가 큰 초기단계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안 하는 성향이 강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영화: 무조건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투자하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창업만큼은 철저히 투자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함께 네트워크로 성장해야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실리콘밸리처럼 초기단계의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상호 간에 동반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연: 벤처캐피탈이 주식같은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내야 하니까 아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양질의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좋은 아이템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많아야 한다고 봐요. 따라서 국가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양질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중점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규영: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를 분석해서 본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엔젤투자자 같은 투자체들의 활성화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지예: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순수한 의미에서의 벤처캐피탈이 아닌 이익 추구의 벤처캐피탈처럼 성격이 바뀐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선순환벤처생태계 조성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상정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영화: 벤처기업은 물론 벤처캐피탈 시장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본받아 '후츠파 정신'과 같은 도전정신이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 내에서 취업에 얽매이지 않고 창업정신을 장려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벤처캐피탈, 벤처기업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민연: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인적자원이 중요하고 이런 창의적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많이 들어가야 벤처캐피탈들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창의적이고 양질의 인재들이 대기업에 많이 가는 현실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인재들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규영: 정부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초기단계의 창업기업에게 투자를 해야 민간벤처캐피탈의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준: 캐피탈은 자금회수를 중요시할 게 분명한 데 처음에는 손실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장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연: 하지만 벤처캐피탈이 위험도를 감수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위험도가 큰 만큼 고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인 데 초반에 손실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투자하는 건 90 개를 실패하고 1 개를 성공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수익 창출가능한 양질의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위험도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준: 오로지 민간벤처캐피탈만의 투자가 아닌 공공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통해서 위험도를 줄이고 신뢰감과 안정감을 준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찬복: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정책들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기 위해선 그런 정책들이 꾸준한 감독 하에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예: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해선 고급인력을 벤처기업에 많이 넣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높잖아요. 이를 반대로 생각해서 많은 청년실업자들을 교육을 통해서 고급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차원의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준: 외국자본을 많이 들여오기 위해서는 위험도가 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자본에게는 수익에 붙는 규제를 해제시켜주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영: 이스라엘 요즈마펀드와 같이 대기업주도의 모태펀드가 아닌 국가 주도의 모태펀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나: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보자면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해서 민간벤처캐피탈이 가지는 위험도를 떨어뜨리고 신뢰감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민간 벤처캐피탈 내에서도 벤처캐피탈간의 네트워크 형성, 이스라엘 '후츠파정신'과 같은 도전정신의 필요, 와 같이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벤처캐피탈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국가의 장려가 필요하고 국가 주도의 모태펀드 형성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4 차 명지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③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송경림(행정 2) : 안녕하세요. 제 2 차 서울여대 선진화 연구모임 진행을 맡은 송경림입니다. 이번 74 차 월례토론회 주제는 “창조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할 주제는 창조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창의적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실질적 방법과 창업 활성화 방법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를 본다면, 스티브잡스와 같은 창의적 혁신가를 실질적으로 발굴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우, 창의적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닌 최고의 샐러리맨을 양성하는 교육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험기간을 살펴보더라도 모두들 스펙을 위한 학점을 위해 전공서적을 암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러한 교육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보다는 대기업에 적합한 샐러리맨을 양성하는 교육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 역시 창업을 꺼리고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선호하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이 느끼기에 창업보다는 안정적이고 돈을 더 많이 주는 대기업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창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창업을 시작하는 초년생들에게 자금을 얻기 위한 융자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사업에 있어 실패 경험은 용기 있는 행동이며 사업가에게 필수적인 조건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번의 실패는 인생을 돌이 킬 수 없는 경험으로 치부되고 도전한 자에게는 빚만 남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는 금융업 쪽에서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담보로 돈을 꿔주는 관습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학에서 창의적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가 “나는 대기업에 취직할거야”가 아닌 “요즘 누가 대기업 취직해?”라는 분위기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적자원의 확보가 불확실하다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과 같이 임기 이후 사라져버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혜진 학우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혜진(의류 2) : 저도 송경림 학우의 의견 중에 대학 교육에 대해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 관련 법들이 모두 4 년제 대학에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생산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반대로 4 년제가 아닌 전문대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대학에서는 이미 산업협력이 발달되어 있는데 4 년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산업협력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맞춰진 틀에 고정된 인재가 아닌 틀을 벗어난 창의적인 인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방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4 년제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유진(행정 2) : 저는 오히려 4 년제는 학문을 깊이 파고드는 것이지 창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문대가 창업과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자들 역시 4 년제에서 발굴하려고 하고 대부분 4 년제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모습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전문대가 4 년제보다 낮다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업에 대한 능력에 있지만 전문대를 가기보다는 4 년제로 진학하여 자신의 꿈과 관련 없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전문대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무조건적인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좀 더 자신의 꿈과 연결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미선(행정 2) : 저는 실질적인 인적 확보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대학에서 틀을 잡고 교육시키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의 경우, 비서와 승무원을 밀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좀 더 자신의 성향과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후배의 멘토-멘티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대학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에서 생산직을 양성하려고는 하지 않고 대부분 선호하는 직업만을 우대해주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에서부터 다양한 인재들을 인정해주고 다양하게 발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진(의류 2) : 하지만 저는 학교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무직과 같은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4 년제를 많이 선호하고 설미선 학우가 말한 생산직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전문대를 선호하고 전문대에 더 특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미선(행정 2) : 저의 의견은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4 년제도 전문대가 더 안 좋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대에 더 능력이 있다고 해도 4 년제로 진학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부 잘했어도 자신의 꿈을 위해 전문대를 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 주변 사람들도 좋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문대에도 회계대학, 세무대학 특성화된 대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4 년제 회계학과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분위기 자체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유진(행정 2) : 저도 우리나라의 대학은 서열만 있을 뿐 교육의 차이가 있나 의문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대학 이름만 다를 뿐이지 배우는 것은 비슷비슷하고 학교마다 다른 특성이 있나 의문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만 하고 인서울 4 년제에 가기만을 원하는 이러한 사회분위기 자체가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지 (공예 2) : 저도 대학교육의 문제점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꿈보다는 더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공부를 해왔고 대학에 올라와서도 고등학생의 연장선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제가 창의성을 개발하며 다양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과제를 하고 시험 기간이 되면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보는 조금 자유로워진 고등학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교육이 좀 더 창의성을 개발해주고 다방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교수님과도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유진 (행정 2) : 저도 박민지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학교의 경우 “창의적 사고”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하는 수업이지만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창의성을 상대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창의성을 늘릴 수 있는 교육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진 (의류 2) : 지금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전문경영인에게 필요한 능력이 경영능력, 회계적인 능력도 있겠지만 다양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자율전공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전공을 선택하는 과를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세대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지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없애려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를 폐지하는 이유는 자율전공 후 전공 선택에 경영, 경제로 너무 몰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이 온 것은 기업에서 대부분 상경계열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하고 이에 따라 상경계열의 학과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국어국문학과를 폐지하겠다는 학교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대학이 취직을 하기 위한 중간지로 변모하는 것이 정말 옳은 교육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저는 대학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공부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민(서양화 2) : 우리나라의 교육이 변질된 시점은 6.25 전쟁 이후 주입식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0 년대 급속 성장으로 인해 창의력은 배제하고 빠른 것만 중요시했기 때문에 창의적인 교육은 중요하지 않았고 암기적인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후진국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스위스 같은 경우 실업률이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볼 때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15%만 고등학교를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모두가 엘리트가 되기를 원하는 사고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급진적인 제도 변화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1 등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학생 때부터 자신의 길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경우, 직업학교가 굉장히 잘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직업학교도 없을 뿐 더러 상고, 공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 년대에는 좋은 상고, 공고가 존재했고 그렇게 취직해서 은행의 지점장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대학이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의문입니다. 모두들 좋은 대학을 원하고 모두가 경영학과를 원하고 이러한 획일적인 삶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옳은 것일까요? 저는 제도보다는 우리나라의 사고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진(의류 2) : 실제로 어릴 때부터 하는 적성검사도 개념이 모호하고 부모님들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자신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지민 (서양화 2) : 즉, 우리나라는 모두가 1 등이 되기를 원하는 교육이 아닌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경림(행정 2) : 교육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창업에 대한 의견 있는 학우 없으신가요?

장혜정 (의류 2) : 지금 현재 미래창조 과학부가 주장하는 것이 ICT 산업과 소프트산업기반으로 하여 사업들 간의 융합 속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삼성이나 LG 의 기술을 강점과 싸이의 한류열풍과 더불어 문화 콘텐츠가 급상하면서 두가지를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정신을 가지고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창업군을 만들고 혁신과 창조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서 학우분들이 말한 것과 같이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초, 중, 고부터 창의적인 교육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육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과 소프트산업 기술을 영어와 같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창업에 대한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고 시장 분석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학생들이 창업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창업 도전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반면 미국의 실리콘벨리의 성공에는 엔젤투자자가 있었음에 있습니다. 그들은 선의의 마음으로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고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담보를 요구하는 것 없이 투자한 기업이 잘 크면 다음에 엔젤투자자 역할을 해라는 무언의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블랙엔젤투자자로 계약서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특정 자본과 기업의 일부 권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창업 실패 시 자신들의 담보가 모두 끌려가 우리사회의 창업의 실패가 인생이 망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고 국가에서 인증하는 엔젤 투자자들을 만드는 등 노력을 통해 대학생들이 더 혁신의 기술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창업을 밀어주면서 대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속 없이 진행되는 것이 많고 겉으로 드러나는 식의 모습이 많습니다. 또한, 창업 공모전에서도 공모전 헌터로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고 돈만 받고 사라지는 것과 같은 문제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창업에 대한 모순점들을 찾고 정부의 노력으로 개선시켜야 정말 창조경제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경림 (행정 2) :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비슷하게 송도에 실리콘벨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인데요. 우리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학우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혜진 (의류 2) : 송도가 실패작으로 끝난 이유는 정부의 단기적이고 급진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습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리콘벨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여주기 식으로 단기적으로 무언가 이루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윤유진 (행정 2) :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항상 바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는 식의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모습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혜진 (의류 2) : 맞습니다.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야 했지만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의 실리콘벨리만의 특징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송경림 (행정 2) : 실제로 저도 우리나라의 송도가 실패한 이유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할 만한 우리나라만의 매력 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서 송도 같은 시도를 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에 맞는 창업 인재들이 많이 생겨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송도도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혜정(의류 2) :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 목표만 내세우고 실속과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행동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창업 교육, 캠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었다는 결과만 있고 실질적인 도움 측면에서 아직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송경림(행정 2) :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확보가 중요하고 이러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창업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의 모습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창업을 도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④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소은(중문 3):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습니다.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바탕에서 기술 융합을 통해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산업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내용을 여러 방면에서 토론해보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방안이 어떻게 제시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근혜(국문 3):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 그러니까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도 여러 번 들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어서 이번 토론은 보내주신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조경제는 창의력이 기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창의적 인재의 필요성이 어느 정부 때보다도 주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재원(중문 3):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부 때도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교육 현실이 창의성의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현재의 공교육은 입시위주로 치우쳐 학생들의 생각을 획일화시키고 상상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는 말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정수정(국문 3):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입시에 치우쳐 창의적인 상상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교육제도 안에서도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 동아리활동 등을 활용한다면 인재육성에 있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근혜(국문 3): 맞습니다. 지금의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대체할만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한 입시제도는 유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시제도를 비난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재원(중문 3):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 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그다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학생들이 중학교에만 올라가도 내신경쟁이 치열하고,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입시시험을 위해 이미 중학생 때부터 입시지옥에 뛰어듭니다. 그러는 와중에 학생들이 체험학습이나 동아리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근혜(국문 3):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는 여러 동아리에 참여했었습니다. 1 학년 때부터 체스부나 사진부, 배드민턴 동아리 등에 들었지만 학생들의 분위기가 동아리에 참여하기 보다는 동아리시간에 교실에서 자습을 하기를 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입시경쟁 때문에 동아리활동이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정수정(국문 3): 저도 고등학교 3 학년 때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시간이 자습시간처럼 변했고 3 학년에게는 명목상에만 동아리활동이었지, 막상 참여는 제한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의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혼자만 교실에 남고자 하는 학생이 없을 것입니다.



임근혜(국문 3): 동아리뿐만 아니라 체험학습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경험을 넓힐 수 있고 그것이 창의력의 바탕이 되는 상상력을 키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은 아이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어 오히려 창의력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교육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재원(중문 3): 저는 창의력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창의력교육에 대한 방향을 잡고 그것을 확대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넓고 아직 어느 한쪽으로 편협하지 않은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근혜(국문 3): 아이들이 꼭 한가지의 방법만으로 창의력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창의력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중문 3):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창의력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공교육적인 측면을 크게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학습, 대외활동 그리고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창의력교육도 필요하겠지요.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방안 모두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과제가 꼭 한가지 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많이 나오기를 바래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⑤ 삼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사회자 신동일:
지금부터 제 3 차 삼육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 다루어질 주제는 18 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창조경제 창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에게 창조경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척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창조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 등의 모범사례를 들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식의 창조경제는 어때 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합시다. 사실 이번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창조경제란 슬로건이 나온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게 창조경제라는 바람을 불어넣는데 실패 또는 미온적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는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우석: 숙명여대에서 창조경제 학과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확실히 정립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벌써부터 창조경제와 관련된 학과들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는 지극히 리스크가 큰 행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주변의 지인 들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을 보아도, 레몬에이드를 판다 던 가, 피자를 만들어 판다던가 하는 창업 Mind 가 널리 깔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모호한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좀 더 가시화, 구체화 시켜서 젊은 예비 창업자들이나 중소기업 Owner 들에게 가치정립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나간다면 창조경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발전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 승영: 난 반대, 현재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창조경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수준이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의미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데, 현재 대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창업에 필요한 지식수준이나 자본수준이 낮다고 봅니다. 결국 창업에 해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실패할 시 학업에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김지영: 제가 관심 있는 게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Exhibition) 산업이란 건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강조가 되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국제 컨퍼런스와 관광산업의 융합사업인데. 저도 처음에 MICE 산업에 대한 관심과 발전책이 국내엔 없어서 좌절을 했던 기억이나는데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창조'에 대한 열망이 국가적으로 융성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MICE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창조경제의 긍정적 실 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업으로만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기엔 박근혜 정부도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창조경제를 주창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제 생각엔 창조경제에 위험 부담이 없다면 그건 창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석: 창조경제라는 게, 창업을 하라 이건데, 창업을 시도하면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만큼 창업이 힘든 이유가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끌어온 자본도 없어서 실패하는 것 같은데. 대학시절부터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대학교육과정에서도 창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진정 대학생과 청장년층의 창업 마인드 고취를 위해선 고등교육부터 창업에 대한 강의를 많이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부입장에서는 지식적으로 창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백우석: 요즘 창업 박람회가 참 많은데요. 솔직히 가는 사람만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실에만 앉아서 주입식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창조의식을 바라는 게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김지영: 창조경제가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에 대비해 선진형 교육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에 필요한 젊은 청년들의 창의력 수준자체가 미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성세대에서 먼저 젊은 층을 위한 창의력 키워주기 분위기가 형성 되어야지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모호하게는 들리지 않을 거 같아요.

백우석: 동반성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창조적인 중소기업들의 기술들을 많이 가로챈다고 들었어요. 대자본 기업가들도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들을 훔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 투자를 통한 동반성장 도모의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은구: 일단 창조경제, 경제민주화도 기본적으로 창의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확실히 정답주의 교육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던 외국 선진교육을 보았을 때 A 는 B 가 아닌 알파, 베타, 오메가 등 다양한 답 도출이 가능한 답 도출 방식에서부터 한국교육과는 차이가 나는 걸 봤어요. 이러한 답 도출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도태교육이 창조경제의 기본적 성립 자체를 방해하는 악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자면, 작게 보면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점 상인들도 함께 흥하자는 가치가 들어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분명 대기업에게 우리나라가 의지하는 것은 확실하나, 대기업 때리기가 아닌 동반성장이라는 기본가치관이 정립해야, 창업과 스타트 업이 흥하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창조경제는 기존 학문의 융 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를 위해선 HICT(HumanInnovation Creation Technology) 의 융 복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3 번째로 진행된 삼육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통해 대학생들이 몸소 느끼는 창조경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창조경제는 Start up 과 창업의식 유도라는 의견으로 좁혀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연구모임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에 대해선 창조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적극적 교육이나 제도적 장려책의 미비를 언급하며 장기적 투자와 발전 프로세스를 고지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 또한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보다 실증적인 교육과 진취적 의식 배양을 위한 융 복합 학문의 중요성과 창업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흥미로웠습니다.

⑥ 아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홍용남(아주대 미디어 3) :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74 회 월례토론회 주제 '창조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우선 '창조경제' 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혼선이

있고 개개인마다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 지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병현(고려대 디자인 2) : '창조경제'의 본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국내 대학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홍용남 사회자가 쓴 글에 적극 공감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내막에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앙트프러너쉽이라고 불리는 혁신적 기업가 정신 교육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단기간에 이루는 것이 아닌 장기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이 창조경제를 이루려면 반드시 교육적 진보가 거듭돼야 한다고 봅니다.

표재우(고려대 디자인 3) : 저는 창조경제를 '창업'에만 귀결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상인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상인의 좋은 물건을 제값에 사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의 순환이 창조경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인이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선 급변하는 소비심리를 읽어야 하는 등 다양한 창조적 행위가 뒷받침 돼야만 합니다. 창업뿐 아니라, 기존 프로바이더들이 세계화된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찾아가는 과정이 창조경제의 달성에 필수요소라고 봅니다.

김상원(고려대 디자인 3) : 두 분 모두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경제에 '감성'을 불어넣는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정서로는 창조경제를 이루기 힘들다고 봅니다.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경제를 정치로 끌어오지 않고 경제 그 자체로 바라보며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약자가 혁신을 만들어 강자가 되는 구조가 아닌 무조건적 약자 배려로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고려대 디자인 4) : 세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딱히 정의내릴 것이 없습니다. 경병현 학생의 생각처럼 저도 창조경제의 본질이 기업가 정신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실리콘밸리와 같은 환경을 조성해 줘봐야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같은 인재가 없다면 세계적 기업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최 우선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홍용남(아주대 미디어 3) : 창조경제에 대해 역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군요. 여러분 모두 창조경제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순환고리를 강화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IT 벤처 붐도 겪었던 우리나라가 왜 세계적 IT 기업을 탄생시키지 못한 걸까요? NHN 의 네이버도 구글의 아성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시장 점유율만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뭘까요?

경병현(고려대 디자인 2) : 분명 NHN 은 뛰어난 기업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구글과 네이버의 시작이 달랐습니다. 구글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모은다는 일념 하나로 시작된 기업입니다. 데이터마이닝과 서칭을 혁신적으로 진보시킨 기업이죠. 네이버는 다릅니다. 다음-네이버-엠파스-심마니 등 국내포털사이트 춘추전국시대에서 네이버가 승자가 된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지식인 서비스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애용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를 외국에서 볼 일이 있나요? 지식인 서비스의 본질 자체가 국내 시장의 선점을 위한 것입니다. 세계화를 노린 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박정현(고려대 디자인 4) : 그럼에도 NHN 의 라인은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요?

경병현(고려대 디자인 2) : NHN 의 대표 서비스인 네이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인은 애초에 NHN 재팬에서 프로바이드 했고 카카오톡으로 점철된 국내시장 대신 일본으로 타겟을 돌린 경우죠.

김상원(고려대 디자인 3) : NHN 은 성공한 기업이죠. 국내 IT 최고의 기업으로 불릴만 합니다. 그런데 벤처 붐 때 다른 기업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다수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실패한 사업가는 비즈니스계에서 매장하는 분위기 입니다. 다들 그걸 지켜봤죠. 결과는 이제 겁이나서 앞으로 창업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창업자가 실패하면 안됩니까?

경병현(고려대 디자인 2) :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성공사례, 실패사례도 보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실패한 창업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지 충분히 학습을 시키자는 겁니다.

표재우(고려대 디자인 3) : 기업가 정신 교육시키면 소비자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뚝딱뚝딱 만들어지나요?

경병현(고려대 디자인 2) : 물론 아니죠. 하지만, 혁신적 기업을 탄생시킨 국가 중에 기업가 정신을 등한시 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창업왕국 이스라엘은 군대에서 기업가 정신을 배우죠. 몸으로요. 표재우 학생은 기업가 정신 수업을 수강해본 적이 있나요?

표재우(고려대 디자인 3) :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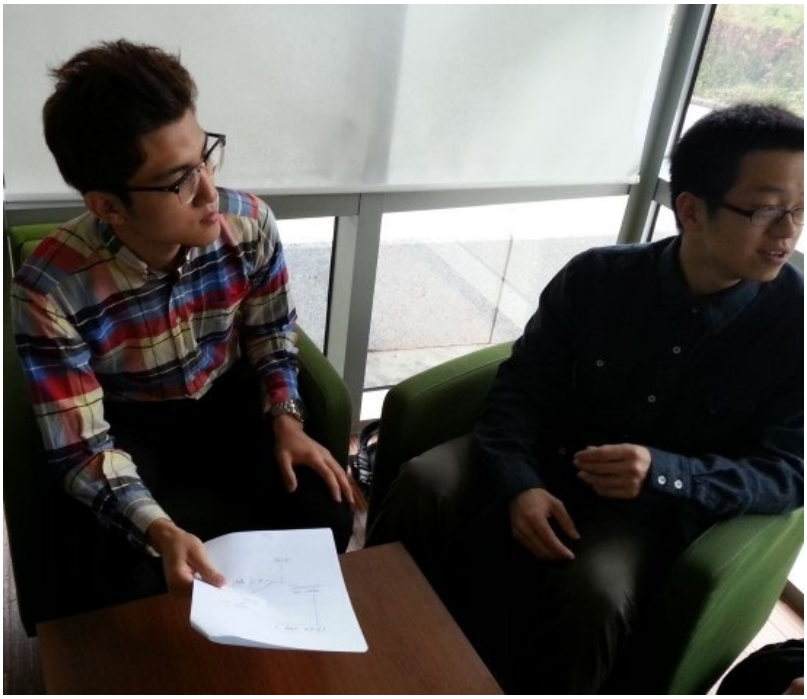
경병현(고려대 디자인 2) :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창업할 사람들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줄 착각해요. 리더쉽은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홍용남(아주대 미디어 3) : 창조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대학생이 아닌 기존 창업자들이나 직장인들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여 창조경제를 창달할 수 있을까요?

경병현(고려대 디자인 2) : 아까 표재우 학생의 말대로, 생산자는 좋은 프로덕트를 생산해 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뿐 아니라, 의사결정도 때로는 매우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서 기업가 정신을 몸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책을 찾아 읽는다거나 하는 행동도 중요하겠죠. 사실, 이러한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절실한 사람이 중요한 지식을 찾아 남들보다 앞서나가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데, 왜 절실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을 갖추도록 방안을 세워야 하는거죠?

김상원(고려대 디자인 3) :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실패하게 놔둔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않고선 멀리 갈 수 없어요. 저는 경제를 감성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지만,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게 놔두는 게 동물진화에 반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우리 사회는 실패한 사람들의 돌발 행동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위협요소를 갖고 있어요.

표재우(고려대 디자인 3) : 강자독식으로는 창조경제를 창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등장한 것이죠. 단순히 낙수효과가 아니라, 악어와 악어 새처럼 서로 상호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홍용남(아주대 미디어 3) : 이제, 논의를 모아봅시다. 창조경제를 창달하기 위해 첫째로, 기업가 정신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하였고 둘째로, 올바른 정책 결정을 위해 경제를 정치화 시키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의견으로는 생산자가 세계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으로 혁신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경병현(고려대 디자인 2) : 그렇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하직원으로서 회사와 팀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도 기업가 정신의 일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창업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숙지해야 할 필수적 내용들이죠.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밑바탕 된 인재들이 이룰 혁신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김상원(고려대 디자인 3) : 약자는 없습니다. 아직 강자가 아닐 뿐이죠. 국가가 갓 창업한 기업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큐베이터의 역할일 뿐입니다.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기업은 정글 속의 강자인 초대형 기업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을 못 이기면 세계에서도 못 이깁니다. 정책결정에 있어 무조건적 약자보호로 경쟁력 약화를 이끌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창업자들의 실패에 대한 안전망과 도전에 대한 보상도 같이 진행돼야겠죠.

표재우(고려대 디자인 3) : 동의합니다. 이상한 상품 팔아놓고 옆집보다 장사 안 된다며 분통터뜨리는 창업자가 돼선 안됩니다. 창업자에게 있어선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를 져버리면 댓가를 얻지 못하죠. 창업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여 혁신적 기업의 모태를 이룰 수 있다면 창조경제 달성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고려대 디자인 4) : 무엇보다도, 창조경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책적 변화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겠죠. 창업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바뀌어야 하고요, 아직은 사회 전반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된 나라니까요.

홍용남(아주대 미디어 3) : 오늘도 열띤 토론 펼쳐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 인재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사항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 질 좋은 상품을 만들려는 노력, 패배에서 배우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이 모든 것이 모여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의견들 개진해준 경병현, 김상원, 표재우, 박정현 학생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화 과제 34:

창조경제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

(제 92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김다혜(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울 방법은?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노동, 연금, 가계부채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 개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문제 또한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관련 정책이 성공하려면 첨단 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가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외국기업들이 원활한 투자를 주도할 수 있는 조건이 미흡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제 92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 실현과 외국인 투자기업: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의 주제로 외국인 투자기업 CEO 들과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 많은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

발제자 및 좌장인 안충영 동반성장 위원회 위원장은 FDI 의 투자환경 조성, 지적 재산권의 보호, 벤처 창업 독려, 노동시장의 유연성, 학생들의 창의성을 위한 교육 개선, 대 -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역 창조혁신 센터 활성화 방안 등 창조경제 창달을 위한 필요조건에 대하여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토론자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는 순위'에서 한국은 144 개 국가 중 133 위였다."라고 하면서 "정책 투명성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자 루카 부데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정책 입안은 일방적인 경향이 있는데 민간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고,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한국 역시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며 "근무시간에 근거한 임금체계보다 성과에 근거한 보상으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토론자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이나 외투기업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소통을 강화해서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다양한 인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지역별 창조혁신센터 활성화 방안- 지방 인재 공급과 클러스터환경 조성

그 중에서 창조경제 건설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 17 개 지점의 지역혁신센터는 FDI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외국인 기업들은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 혁신 센터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역혁신센터에 공급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방대학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 향상이 필요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특성을 잘 반영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홍보를 진행하여 외국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효익성을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겠죠.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 개혁을 통한 투명한 정책 필요성

또한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정책'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FDI 유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진입장벽과 불필요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 이후에 자주 바뀌는 정책으로 투자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투명한 규제 개혁과 인내심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를 진행하고,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이니셔티브, 벤처캐피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술은행 제도 등 여러 훌륭한 제도에 대해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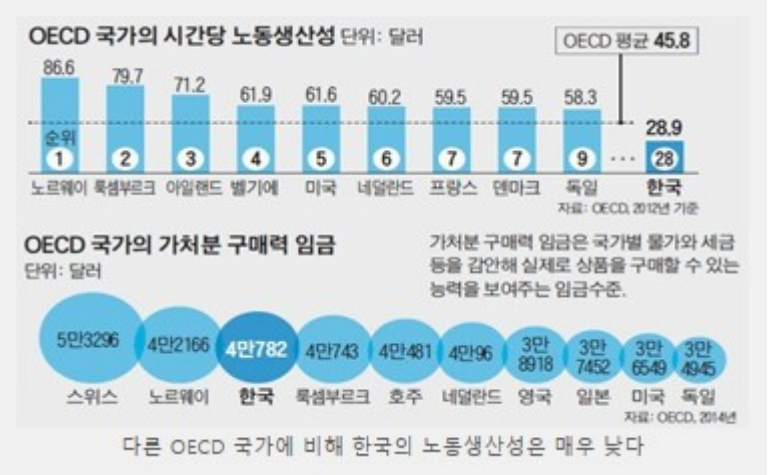


우수한 실력을 갖춘 대학생들이 FDI 유치에서 중추적 역할 수행

마지막으로 한국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많음에도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데, 대학생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과감하게 발휘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FDI 유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 실현의 지름길은 곧 FDI 를 유치하는 것이고 단기적인 정책 시행이 아니라 인내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침체된 경제의 탈출구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김수빈(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대한민국은 불과 반 세기 정도만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매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삶은 힘겹기만 합니다. 이른 출근, 잦은 야근에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OECD 는 '2015 년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한국은 1 인당 GDP 는 OECD 국가 중 상위 25%까지 발전했으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고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상위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출처: 머니투데이)

또한 달러로 표시한 가처분 구매력 임금은 높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임금부담이 크게 작용합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효율은 떨어지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한 당연히 나오기 어렵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회사에서 시간만 때우거나, 피곤해서 일을 대충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 한국선진화포럼은 '창조경제 실현과 외국인 투자기업 :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 외투기업의 중요성과, 이에 필요한 노동유연성과 노동생산성 증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정책과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한국의 정책 투명성 문제를 강조하였습니다. 루카 부데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역시 정책 입안에 있어 민간 의견의 반영을 주장했습니다.

우에노 아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지적하며, 임금체계가 근무시간보다는 성과에 근거한 보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21 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지식집약적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개인의 창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기업은 첫째로 근무시간 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우에노 아스아키 사장이 언급했듯, 이제는 근무시간보다는 성과 중심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부 또한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제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 내부의 환경이 조금씩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안드레 노톰브 한국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토론회에서 '한국의 신입사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 상사의 지시나 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신입사원과 상사 모두 과도한 수직적 위계에서 벗어나, 함께 토의하고 협의하며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정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토론식, 발표식 수업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잦은 야근보다는 노동시간이 짧더라도 효율적인 노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산성 증대와 유연성 증가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도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개인의 창의력 증가는 창조경제의 확립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 모두가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③ 김승찬(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창조경제는 4대 기술의 융합이 전제되는 경제다.

대한민국 정부는 악화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경제란 이름의 콘텐츠 창출형 융합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T(ENERGY) BT(BIO) IT(INFORMAITON) NT(NANO)기술의 융합을 이용하여 만든 콘텐츠로 세계시장을 노린다는 게 창조경제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창조경제에는 사람이 가진 창의력과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데 그 창의력과 기술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와 국내외 유 무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의 발전된 지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창조경제를 모토로 내세운지 3 년이 지나가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2 월 26 일 (재)한국선진화포럼 제 92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국인 CEO 분들과 토론을 하였고 여러 정책적인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외국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루카 부데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사무 총장은 외국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톰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사내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한국 역시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성과에 근거한 보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에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 중 우에노 야사키 한국제록스 사장이 언급한 **"창조경제의 실현은 인적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며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미국의 달 착륙 뒤엔 대규모 교육투자가 있었다.

1950 년대 미국은 소련보다 뒤쳐진 우주경쟁을 만회하기 위해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서에 있었던 창조론을 퇴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독교적인 문화가 강하던 미국인들에게 있어 파격적인 조치였고 이러한 교육 투자 끝에 우주개발경쟁에서 소련을 역전하고 실리콘 벨리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경제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와 CEO 분들의 조언처럼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인적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며 인적자본에 투자하려면 교육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교육의 역량으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 한계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월례토론회에선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야 창조경제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외국의 교육기관도 함께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외국인 기업이 국내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넣듯 국내 교육계에도 새 바람을 넣는 겁니다.



유학은 국부유출과 인재유출의 위험성을 수반한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국내 교육환경에 만족 못하고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과정에서 큰 국부유출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유학을 떠난 학생 중 상당수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인재유출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의 교육기관은 국내보다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곳이 많습니다. 그 교육기관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함께 국내에 들여오게 하여 대한민국의 인재가 해외에 나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국부유출과 인재유출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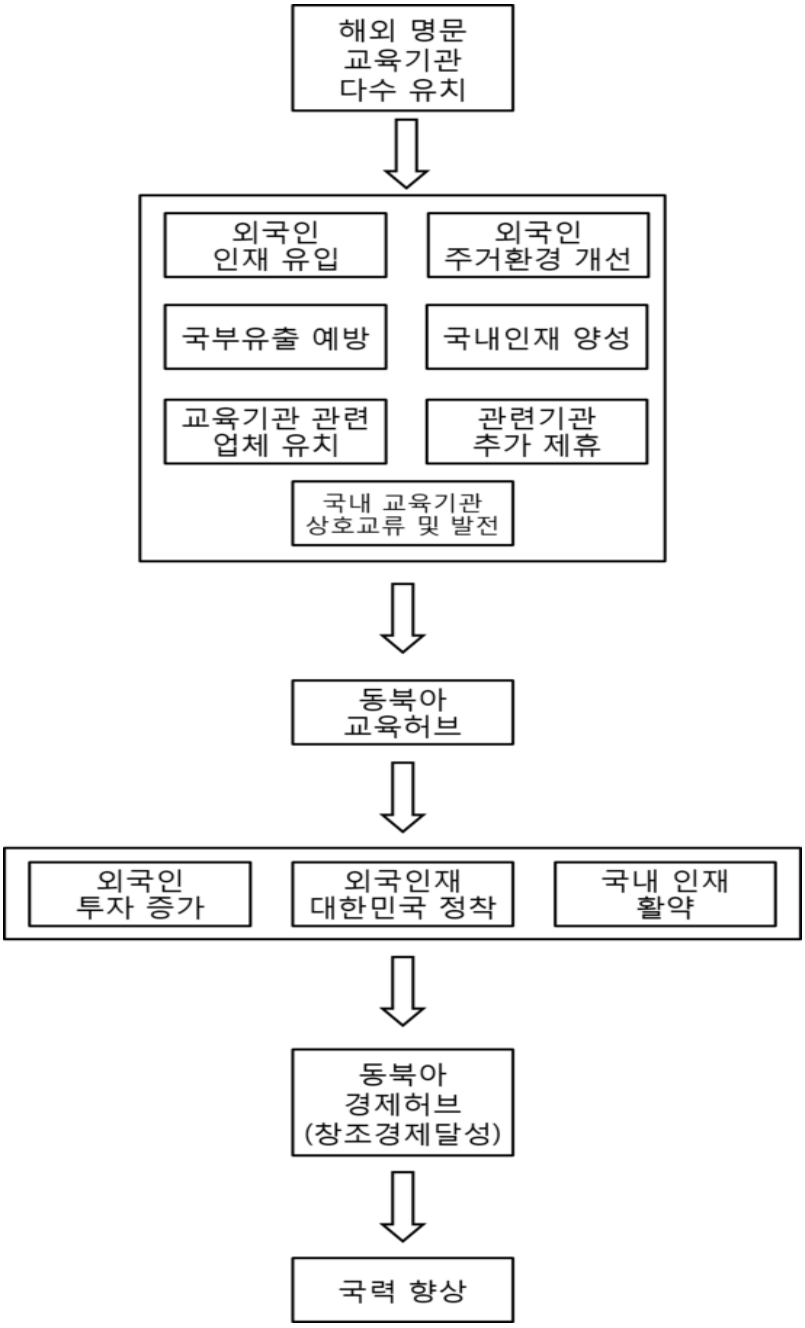


부산 FAU는 창조경제에 큰 힌트를 주었다.

이미 제가 제안하는 일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사과학단지에 독일이 세운 독일국립대학교(FAU) 분교가 있습니다. 독일 본교의 똑같은 커리큘럼과 독일의 뛰어난 기술을 교육받고 독일 유학(FAU 본교)과 유럽지역 취업도 알선 해주고 있어 이 곳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부산 독일 FAU 의 사례를 보듯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로 뛰어난 인재를 국부유출 인재유출 없이 키워내고 있으며 동시에 선진국의 뛰어난 기술까지 쉽게 얻어냈습니다. 외국기업의 기술을 얻으려면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대학교육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산 FAU 하나로도 좋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해외 명문 교육기관을 더 많이 국내 유치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밑의 그림은 그 개념도입니다.



다수의 명문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국내인재를 양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해외인재를 끌어들이는 유인 요인으로 삼고 국내 교육기관과 상호 발전하여 동북아 교육허브가 되야 합니다. 교육허브가 된다는 것은 높은 R&D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기업들에게 큰 메리트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외국기업도 추가로 유치가 가능하고 투자까지 더 받아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며 여기에 국내유치 해외교육기관과 그 해외교육기관과 상호교류한 국내 교육기관에서 배출한 국내 인재의 역량이 가해지면 '창조경제'도 꿈은 아닙니다.

물론 이 교육기관들의 학비가 싼 편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교육기관들이 국내교육기관보다 청년들의 주머니를 더 쥐어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정부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청년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면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는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큰 힌트다.

넓은 범위로 보았을 때 외국인 투자는 기업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와 같은 '외국 사회 간접자본 유치'도 외국인 투자라고 봅니다.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의 잘못된 교육 풍토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외국 교육 기관을 통해 국내 인재가 세계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 실업도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④ 김지용(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현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 박근혜 정부는 올해 창조경제 3 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경제인사들은 한국 시장만의 차별적인 매력을 갖추어야만 외국인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17 개소의 창조경제 지역혁신센터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 지역들이 차별화된 '테마'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조 경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여러 의문들에 대한 해답과 더불어 더 나은 방안들을 찾기 위해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창조경제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제 9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의 좌장 및 발제를 맡았고 토론 패널들로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 루카 부데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안드레 노톰브 Solvay 코리아 사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의 발판이 될 전국의 17 개 창조경제 지역혁신센터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루카 부데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방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패널들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에 앞서 지역 투자처들에 수도권 지역과는 다른 차별화된 투자 메리트를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가 수도권 지역 투자와는 다른 차별화된 메리트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지방 지역에 대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혁신센터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투자처들이 차별화된 '테마'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지역이 특정 테마를 갖추어 투자 활성화를 달성한 사례로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 서부지역인 툴루즈와 같은 경우 지역 생태계에 따라 바이오테크 산업 지구로 지정되거나 화장품 산업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역 생태계는 자원 접근성, 교통편, 예상되는 고객층을 비롯한 고급 인적 자본 등 그 지역의 특징적인 경제 환경을 말합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지역 생태계를 잘 활용하여 여러 테마 산업 지구들을 지정하였고 전국적인 벤처 창업 활성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충북일보〉

우리나라에도 프랑스와 같이 지역 테마를 잘 활용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오송 지역과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오송 지역은 바이오, 의료 산업 지구로 홍보되어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테마'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 자본 및 편리한 교통, 통신 등을 내세워 테마 지구들을 지역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설립한다면 제 2, 제 3 의 오송 지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벤처 창업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는 한국의 창조경제 현실화에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국 지방에 설립된 17 개의 창조경제 지역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투자처들이 차별화된 테마를 갖추고 이를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⑤ 김한준(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경기 불황은 많은 젊은이들을 취업전선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속에 '창조경제'실현을 외치며 전국 17 개 시도에 창조혁신센터를 세우고, 신 산업 및 벤처 창업을 도모하고 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FDI)실적부진 등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합니다.

창조경제실현에 외투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크게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실적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한국 선진화 포럼'은 '창조경제 실현과 외국인 투자기업 :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 9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충영 동반성장 위원회 위원장은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쉽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관점을 바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애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은 한국의 정책 투명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고,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 코리아 사장은 한국의 기업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분야에서 한국의 인재들이 좀 더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카 부데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취약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저한다는 점을 들어 외국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였고,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보다 성과에 근거한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창조경제의 실현, 외국기업의 투자활성화로 시작 해는건 어떤가요?

2006 년에서 2015 년 3 분기까지 국내유입 FDI 누적액은 760 억 달러에 불과한데 반해 동 기간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액은 2080 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불균형 상황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17 개 시도에 지역혁신센터를 지정하고, 벤처창업에 대한 투자폭을 넓히는 것 외에도 외국기업들이 벤처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외국의 벤처육성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에이미 잭슨 소장은 한국의 대학생들 중 스티브 잡스나 빌게이츠처럼 대학을 자퇴하고 창업전선에 뛰어든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지적하며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창업에 뛰어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티브 잡스나 빌게이츠처럼 적극적으로 창업전선에 뛸 수 있는 환경이나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접은 채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의 벤처육성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사 '프리'의 주도로 파리 13 구에 1000 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다양한 기업 미팅 및 기업행사 그리고 사업협력 네트워킹 형성 등을 통해 기업간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이고 다각적인 협업시스템과 적극적인 노하우 전수 자세를 지닌 외국기업의 투자는 해외자본의 침투와 국내기업 보호라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 많은 벤처기업들이 육성되고,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진정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선 단순히 신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외국기업들이 17 곳의 지역혁신센터와 연계해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벤처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⑥ 박소정(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선진화포럼의 주최 하에 열린 제92차 월례토론회

집권 3 년차를 맞이하며, 박근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성장률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으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기업 창업률도 감소세에 있습니다. 창조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기업 투자 유치 실적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선진화포럼에서는 '창조경제 실현과 외국인 투자기업 : 어떻게 서로 도울 것인가'를 주제로 제 92 차 월례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창조경제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과 연결되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로 이를 인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앞에서도 언급했듯 실적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구축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눈독을 들일만한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망한 벤처기업들을 대기업이 삼켜온 그간의 역사를 보았을 때,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유망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투자하려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안충영 운영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 특히 가장 창의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청년 벤처기업 창업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청년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기술은행 제도 등도 존재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설립되었습니다. 루카 부데 상공회의소 사무총장도 이를 언급하며, 한국의 창조경제 계획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런 다양한 조치들이 존재함에도 한국의 20 대 창업률은 약 4.5%로, 10%대에 달하는 기타 선진국에 비해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벤처창업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구제수단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벤처기업 장려 정책이 투자금을 다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액의 초기 자본과, 취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준비시간, 그리고 불안정성이 있는 창업을 청년층이 점점 기피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정책 투명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한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정책투명성, 즉 정책 입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는지, 사람들이 그 규칙 제정과정에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대한 등급은 144 개국 중 133 위라 합니다.

이렇듯 정책 투명성이 낮은 사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 저하를 불러올 것이며, 청년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기 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젊은이들의 자신감과 도전정신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로 상관에 도전할 수 없는 분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상급자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문화가 창의성을 저하시키며, 두려움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상하관계에서 오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상하문화를 조금 더 개선해 창의성을 높이는 것도 창업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내에서 영어 호칭을 쓰거나 상호 존댓말을 사용하며 평등한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하는 일부 회사들을 본받아, 사회 전체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 벤처창업 활성화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며, 잠재 성장률의 추락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벤처기업의 증가를 가져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난 진정한 '동반성장'의 가능성도 열어줄 것이며, 더 나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불러올 것입니다.

창조경제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핵심이 되는 경제라 합니다. 청년 벤처창업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간다면, 우리 경제도 언젠가는 진짜 창조경제가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⑦ 박재형(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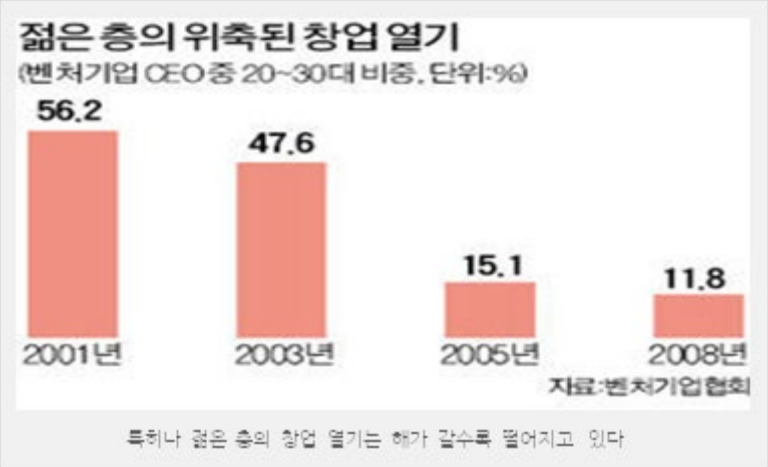


창조경제의 원동력은 창업에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가장 강조한 것이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란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2001 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창조경제란 기존의 산업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산업과 그 안에서 창업을 이끌어내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대통령이 부임한 직후 2 년 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오히려 창업률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등 창조경제의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창조경제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제 92 차 월례토론회에서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출처라면서도 정작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비판하였고 그는 이어 지식집약 및 연구개발(R&D)형 외투기업 유치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다보스포럼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는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144 개 국가 중 133 위였다며 정책 투명성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한국 역시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며 "임금체계가 근무시간보다는 성과에 근거한 보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루카 부데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한국은 유망한 중소 벤처기업이 있어도 대기업이 삼키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 외국 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업률이 낮은 이유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모습 때문입니다. 창업을 했지만 실패를 할 경우 빚더미에 앉게 되며 다시 올라서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창업을 하고 어느 정도 기업을 키워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인수합병을 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창업국가로 불리는 이스라엘은 창업환경이 잘 발달된 나라이다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창업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실패해도 다시 복구 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에선 조성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창업 시 금전적인 혜택이나 창업교육 등을 매달 한 두 번씩은 들을 수 있게 조치를 하고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창업자들에게 성공한 기업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 등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창업교육을 늘리고 창업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창업에서 실패하고 폐업을 하게 될 때도 국가에서 저금리로 돈을 지원을 해주거나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창업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실현은 창업을 유도하는 사회 환경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⑧ 박현진(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관련 정책이 성공하려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창조경제 실현과 외국인 투자기업 :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제 91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에 대한 답으로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규제개혁을 할 경우 외국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 후지제록스 사장은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노동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생산성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고, 루카 부데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정책 입안이 일방적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며 정책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창조경제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만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 후지제록스 사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인적자원이다."라고 하였고,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창의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 코리아 사장은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여, 인적자원과 교육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하였습니다.



90퍼센트가 넘는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한국의 교육열은 전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뜨겁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학 진학률이 90 퍼센트를 넘어설 정도로 세계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은 편인데요. 과연 투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입식 교육을 받고, 대학교에 가서는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머리가 좋고 똑똑한 인재들은 거의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 빠져나가고, 정작 높은 수준의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이나 창업에는 무관심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화해야 할 교육방식

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교육방식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도록 만드는 수업분위기, 그리고 이해보다는 암기, 과정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는 평가방식이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씨앗, 바로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먼저, 교육의 방향이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식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토론은 자신의 의견을 구체화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작정 암기하여 단 하나의 답을 도출해야 하는 암기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응용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길러 줄 것입니다.



변화하는 교육 속에서 꽃 피울 대한민국의 인재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탐낼만한 인재, 나아가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인이 될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꽃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⑨ 백송희(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끝을 모르는 침체 속 위기의 한국 경제, 과연 탈출구는?

한국 경제는 첨예하고 심각한 갈등 속 지난 해 4 분기에는 수출과 내수가 전년 대비 제로성장에 가까운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에 집권 3 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벼랑 끝에 몰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창조경제 3 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갖고 있는 외투기업들을 통해 창조경제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하기 위해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도 "창조경제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를 주제로 2 월 26 일에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패널 토론자 에이미 잭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한국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했지만 한국의 정부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한국 정부와 외국계 기업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예측 가능한 정책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에노 야스야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젊은 세대와 민간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창조 경제의 원천은 인적자원이며 젊은이들의 지지와 노력 없이는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각 지역의 인재를 이끌어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발제자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전국 17 개 지방 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창조혁신센터'가 있는데 이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 소재지에 필요한 우수 인력공급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며 이를 잘 이용하여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 역시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고견에 깊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인력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문제이기에 각 지방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고 더 나아가 그 인재들이 각 지방에 들어서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활약을 하여 지방 경기의 활성화 및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창조혁신센터 제도는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생각보다 미흡합니다. FDI 누적액이 해외투자누적액의 36%에 불과한 이 시점에 각 지방에 FDI 를 유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작 수도권 외의 지방에 입지하여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는 해외기업 반응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FDI를 유치하고 Globalization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에이미 잭슨과 우에노 야스야키는 한국에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적절한 패키지와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대한 홍보 역시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해외 기업이 아무런 정보 없이 서울이 아닌 지방 지역에 입지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앞으로 지역 주도로 그 지방의 테마를 지정하여 특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지방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기존 생태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한편 이를 외국계 기업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그 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홍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적절한 인센티브 및 규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에 많은 FDI 가 유치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나도 많은 제약과 불친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규제를 철폐하되,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구속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선별하여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 많은 규제들은 시장을 왜곡할 뿐 오히려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서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길입니다.

혹자는 외국계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창출한 뒤 일명 먹튀를 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곤 합니다. 이에 에이미 잭슨은 그러한 것은 소수의 기업이며 자신의 기업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며 자금을 투입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계기업들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들 역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여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 노톰브 Solvay 코리아 사장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며 처음 사업의 시작은 다양한 지방에서 시작하였지만 지방 지역에서 사업의 규모를 크게 늘리려고 하자 주위에서는 상당히 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방에는 해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받아 드릴만한 인재가 많지 않다는 이유가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창의적이고 똑똑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려면 각 지방의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저는 전국 17 개 지방 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창조혁신센터에 필요한 우수 인력공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의 대학에 더욱 높은 우선순위의 교육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교육에 많은 보조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을 기피하고 서울만을 선호하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방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배출시킬 수 있는 금전상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⑩ 송민상(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벼랑 끝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며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외국 기업의 투자는 현저히 부진한 상황인데요.

실제 2006 년에서 2014 년 3 분기까지 국내유입 FDI 누적액은 760 억 달러로 같은 기간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투자 누적액 2800 억 달러의 36%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통해 생각해볼 때 한국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현황은 심각한 적자구조에 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기업 CEO 들은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는 '창조경제 실현과 외국인 투자기업 :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제 9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크게 부진하다'고 우선 지적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지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토론자인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구축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한국에서는 투자 규제와 규칙들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또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이 공지되지 않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한국 역시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며 '임금체계가 근무시간보다는 성과에 근거한 보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하였고, 안드레 노톰브 한국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한국에 와서 보니 신입사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 상사의 지시나 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한국 정부가 기업 구성원들 간의 개방적인 소통 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적극적으로 유치되기 위한 과제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적극적 유치, 정책 투명성 재고, 노동생산성 증대, 기업문화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편, 지난 9 일 발간된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FDI 수준은 OECD 가입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FDI 활성화를 위해 기업 환경 및 노동시장 개혁, 세제 효율성 개편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FDI 유치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국가 경제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규제 덕분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앞서 재기된 노동시장 경쟁력의 경우 임금결정 유연성 5 위(한국 61 위), 고용해고 용이성 3 위(한국 108 위)로서 글로벌한 경쟁 시대에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대내외 전문가들과 FDI 유치 상위국가의 경쟁력 원천을 통해 볼 때 FDI 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진입 규제를 없애 나가는 것에 역점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⑪ 송소담(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열쇠, '창조경제'

한국정부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데요. 현재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지식집약형 산업을 유치해야 하고,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을 한국에 유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열쇠라고 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요. 이러한 까닭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시되고 있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어떻게 하면 외국기업투자를 유치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창조경제실현과 외국인 투자기업: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CEO 들을 모시고 지난 2 월 26 일 제 9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발제자 및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주도하였고,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그리고 루카부데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패널로 참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시너지 효과에 대하여 토론 및 정책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에 이미 진출한 혁신적 외투기업들과 잠재적 투자가들은 중요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의 원천이고, 이들이 국내 기업과 연계된다면 창조경제 구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외국기업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지적하며 "임금체계가 근무시간보다는 성과에 근거한 보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고,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외투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한국 인재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한국은 정책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였고,

루카부데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역시 한국 정부의 정책 입안은 일방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하위권 수준의 한국의 정책투명성

실제로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루카부데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역설하였듯이, 외국인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시켜 주어야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려 하기 때문에 정책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정책 투명성인데, 이것이 낮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투명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한국의 정책 투명성 수준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길래 해외 경제인들까지 이를 걱정하는 걸까요?

실제로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 국가 순위를 밝혀 한국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다보스포럼은 한국이 정책 투명성 부분에서 144 개 국가 중 133 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한국은 현재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의 의식개선을 통한 국민들의 의견 반영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정책에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현재 정책결정 단계에 비공식적인 참여자로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한 채 참여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역할에 사명감을 느끼고 적극적이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인들도 의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은 개인의 목표 달성을 정책결정의 방향으로 잡기보다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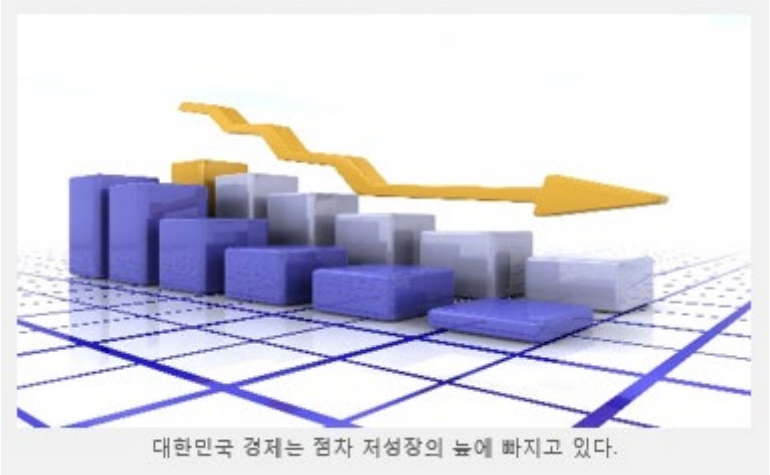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들이 요구됩니다.

물론 정부와 정치인들의 의식개선만으로 정책 투명성을 제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이 의견을 내는데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는 수준이 낮다는 점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반영하는 수준이 낮다는 점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노력도 요구됩니다.

외국에서 온 사신은 과거부터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들이 오고 싶게끔 자국을 정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국에서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게끔 정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정책 투명성 제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은 창조경제와 외국기업투자 유치가 서로 도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여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⑫ 윤수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한민국 경제는 점차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물가까지 0%대 중반으로 떨어지는 3 저(低)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저성장 시대가 예고되는 한편 이로 인한 고용문제의 대두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을 탈출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을 창조경제 실현의 키워드로 삼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각 지역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고, 창조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창조경제타운의 활성화를 도모는 하는 등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현안 이슈에 주목해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도 26 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창조경제 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 CEO 들과 함께 제 9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토론들이 오간 가운데, 그 중에서도 청중들의 이목을 한 데 집중시킨 것은 바로 에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가 던진 한 마디였습니다.

“여기 계신 청중들 중, 내일 당장 학교를 중퇴하고 성공을 위해 사업에 뛰어든다고 말씀 드리면 잘 생각했다면서 두 팔 벌리고 환영해주실 부모님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농담처럼 던진 그녀의 한 마디였지만 청중들 중 그 누구도 손을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선 '성공의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에미 잭슨은 대학을 중퇴하고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놓는 동시에 세계 상위 1% 대열에 합류했던 MS 의 빌 게이츠와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의 예시를 들면서, 창조경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성공에 대한 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루카부데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역시 사회 전반의 'Mind set change'를 통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 또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지적하면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강요하기 보다는 인내와 여유를 가지고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일류 대학에 나와 일류 기업에 취직하는 것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 뼈아픈 지적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KBS 에서 방영되고 있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월수입이 대기업 직장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청년창업가 아들에게 사회적 시선이 나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접고 대기업에 다시 취직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던 아버지의 에피소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성공에 대한 기준'은 크게 뒤틀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동력으로 여겨지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장애물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뒤틀린 성공기준을 바로잡고,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뒤틀린 기준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인 뒤틀린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류 대학을 성공의 목표로 잡고 수능에만 올인 하는 현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창조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학교육 역시 막연한 취업교육이나 지원을 제공하기 보다는, 보다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교육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T 창업의 경우 기본적인 웹 환경 구축과 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자주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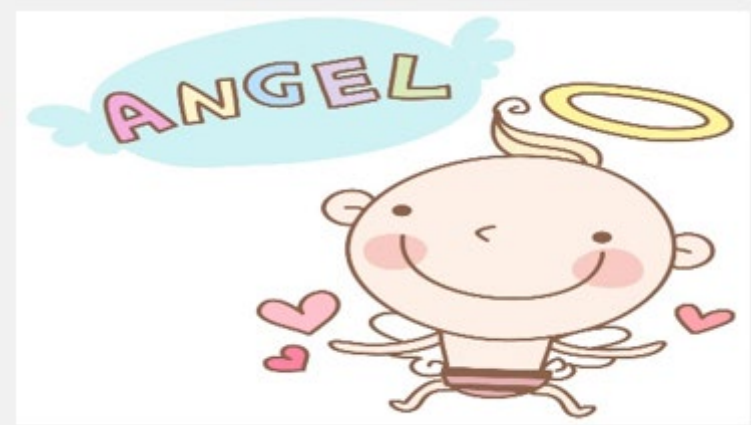
이처럼 창업준비를 위한 실무적인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늘릴 수 있다면, 대학생들 또한 무조건 대기업 취업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창업의 장래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 인재 네트워크를 활성화 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힘써 인재 Pool 을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채워진 인재 Pool 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뛰어난 청년 인재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그들 간에 연결을 도모해 창업에 있어 필요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결합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 취업에 비해 창업에 대해서만 유독 성공기준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했다가 실패할 경우 다시 회생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



금융개혁을 통해 엔젤펀드와 같은 창의적 금융지원을 늘려야 한다. .

특히 창업자들에게는 'Death valley(죽음의 계곡)'라는 어려운 고비를 반드시 한 번쯤은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항상 피할 수 있게 하는 건 무리겠지만, 적어도 Death valley 가 유지되는 기간과 그 험준함 만큼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엔젤펀드와 같이 창의적인 금융지원을 늘려 Death valley 의 위험을 줄여나감으로써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예비청년창업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금융정책을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나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청년 창업 성공 스토리에 대해 부각시키거나
SNS 를 통해 관련 사례들을 널리 전파한다면, 창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동시에 예비청년창업자들이 다양한 사례를 많이 접하고 공부함으로써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는 '언제 중퇴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우스개처럼 나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스티브 잡스, 빌게이츠 외에도 페이스북 창시자 주커버그 등 대표적인 성공 창업가로 꼽히는 이들의 대부분이 대학 중퇴자이기 때문입니다
.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성공에도 창조적 기준을 세워야만 한다..

이제 21 세기 글로벌 시대의 '성공에 대한 기준'은 더 이상 일류대학, 일류기업이 아님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성공에도 '창조적 기준'을 세워야만 진정한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⑬ 이윤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정부가 다방면으로 정책 시행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탈출구를 찾기 위하여 지방에 17 개 창조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아직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6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창조경제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 9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율에 반해, 우리나라로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투자율은 약 36% 밖에 되지 않는다고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발제하였습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에 이미 진출한 혁신적 외투기업들과 잠재적 투자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출처라고 볼 수 있다며 창조경제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창조경제의 창달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구축, 엔젤펀드와 같은 장치 마련을 통한 벤처창업 독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제거, 전국 17 개의 창조혁신센터 차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패널로 참여했던 루카 부데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단순히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들이 벤처중소기업들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또 다른 패널이었던 안드레 노톰브 한국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한국의 기업 구성원간의 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며 상사와 부하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한국에도 필요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 후지제록스 사장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에 있다며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다보스 포럼에서 정책 투명성과 관련한 한국의 순위는 144 개국 중 133 위라는 점을 들며, 한국 정부는 정책입안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업과 정부 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저 역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한국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국투자기업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좀 더 큰 범위에서 국민들과의 제대로 된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관련 지원들과 규제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벤처 창업지원이나 지방지역 창조혁신센터 등의 포함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관련 당사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 없는 정책이겠지요.

따라서 창조경제를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의 말을 잘 듣고 정책을 입안하며, 또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들을 효율적이면서도 매력적이게 홍보하는 일입니다.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간담회를 열어 관계되는 기업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거나 강화되어야 할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 기업 담당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 민간시민, 담당 부처 공무원 등 여러 집단을 모아놓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 논의해보는 공청회 자리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떤 규제 하나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한 쪽의 입장만 들어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한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의 벤처창업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좀 더 많은 이들의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공청회 등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인터넷과 같은 토론의 장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책을 시행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어떻게 하면 수혜자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를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진행한다면 더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들도 국내에서 활동하기 좋아지고 창조경제 역시 좋은 결과를 얻어 저성장의 늪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⑭ 이정진(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 월 3 일 한국과 사우디 정부 간에 창조 경제 협력 추진을 둘러싼 협정이 체결되면서 다시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3 년 차가 되면서 드디어 창조경제를 통한 효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연이은 저성장 추세를 보이는 현재,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유치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통한 벤처 기업 육성과 그로 인한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외 유출 투자액에 비해 국내에 유입되는 투자액이 36%, 즉 3 분의 1 에 그치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창조 경제 실현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입니다.



이에 대해 2 월 26 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하에 '창조경제 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제 92 차 월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발제자에 나선 안충영 위원장은 각 지역에 설립된 지역 혁신센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폭넓은 투자환경의 구축, 벤처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 엔젤 펀드와 같이 창의적인 금융장치의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의 비대칭성 제거 등을 제안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또한 루카 부데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 숙련된 인력에 대한 접근성, 대학 졸업생에 대한 접근성 등이 포함된 개념인 '지역 생태계'에 대해 언급하며, 특정 지역으로 진출할 때 생산성 여부를 따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지역의 경우 산업 인프라와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지인 서울과의 거리가 멀고 지역적 인재의 상대적 경쟁력, 서울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 출처 : 벤처 스퀘어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총 6 개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설치되어 있는 기관으로,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성장을 돕고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5 년까지 17 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멘토링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사업화 개발 자원, 시장 진출 등을 돕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성화하여 벤처 기업 육성을 돕고 외국인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실제로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더구나 대전, 춘천, 제주 등 내가 사는 지역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를 알고 적극 활용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는 대학 졸업생을 이용한 인력,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력을 포함하는 지역 생태계의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과 지자체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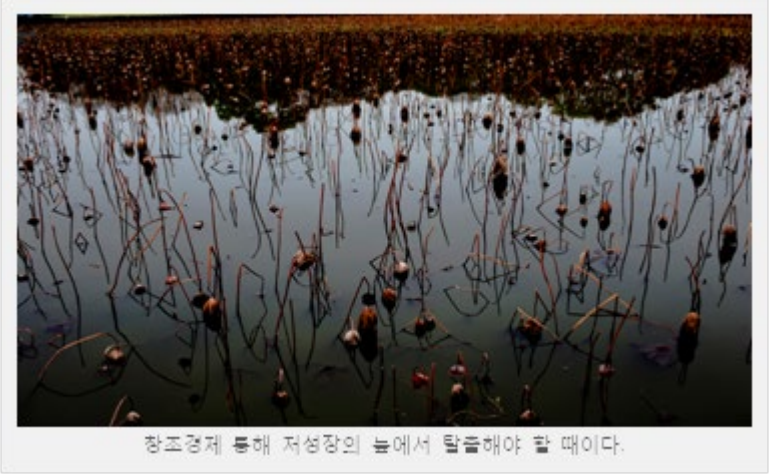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경영학과 등의 전공 선택 수업으로 창업장려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경연을 하고, 경연을 통해 뽑힌 아이디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지역 대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홍보와 동시에 창업을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홍보대사 겸 아카데미를 만들어 보다 많고 다양한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활동을 겸함으로써 지역 대학생들을 활용한 좋은 홍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활성화는 지역 생태계를 살리는 가장 크고 가까운 방안입니다. 이를 통한 벤처기업의 육성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그 첫 걸음은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⑮ 정우재(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과 내수에 있어 제로성장에 가까운 기록을 하며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집권 3 년차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 늪에서 빠져 나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창조경제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유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열쇠인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창조경제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 9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한국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잠재적 투자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창조경제의 구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구축하여 FDI 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한국의 정책은 외국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루카 부데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사무 총장은 유망 중소 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삼키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한다며 외국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음을 지적하며 임금체계가 근무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른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기업 구성원들간의 개방적인 소통구조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한국 신입사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보다는 상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문화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의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FDI)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FDI 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사업 모델을 구축, 매력적인 벤처창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청년들 사이에는 도전이나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미국의 페이스북보다 한국의 아이러브스쿨이, 미국의 왓츠앱보다 한국의 세이클럽이, 미국의 Google wallet 보다 한국의 KG 이니시스가 먼저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최초는 한국에서 발생했지만,

최고의 명예는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한국인들은 창업에 있어서 혁신적인 사례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중고등학생의 희망직업 1 위로 남자는 공무원, 여자는 교사가 선정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벤처창업에 있어서도 청년들의 안정지향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재능이나 창의성을 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 역시 사그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젊은이들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안정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병든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는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즉,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바로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에 대한 편협한 정의가 그것들입니다.



건강한 개인주의가 창조경제를 만든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 만연한 병든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한 '개인주의'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신경쓰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의 잣대와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절을 중요시함에 따라 상하 간에 도전이 불가능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재능과 창의성은 발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의 바른 것과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계급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우는 자세가 기업, 학교 등 사회 내 문화로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즉,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벤처창업 등 도전을 하는데 한 두 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실패자'로 낙인찍어버리는 문화 때문에 젊은이들의 도전적이고 모험지향적인 성향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제 2 의 빌게이츠, 스티브잡스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성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야, 고등시험에 합격을 해야 성공을 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성취를 성공, 실패로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넓히고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개인주의만이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연공서열 문화를 깨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개인의 재능과 창의성이 발현되고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창업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창조경제에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한국을 심각한 문제로부터 구조할 수 있습니다.

⑯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부)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은 무엇일까?

통계청이 발표한 2 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2%에 그쳐 3 개월째 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 중 담뱃값 인상률 0.58%를 제외하면 실제 물가는 오히려 0.06%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해오던 최경환 부총리도 지난주에 결국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이 소비 감퇴로 이어져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규제완화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족과 성장 동력이 탄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과 주가에 버블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만 낳고 있는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무역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도 고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중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이끌어 내야 한다.

첫째, 규제완화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유통법,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전통상권 살리기 등의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남발하였고, 규제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목표로 만든 규제들은 상생은 고사하고 기업 활동이 하향평준화하고 대기업의 꼼수영업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규제들에 발목이 잡힌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비가 위축된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규제들 중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적극적이고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활동을 할수록 경제가 활력을 띠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임금을 높여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높이자는 정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벤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벤처산업의 육성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에 홀로 경제성장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한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선진 산업'을 기반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과학 및 경제 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선진 산업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지식을 가진 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 종사하는 연구개발 중심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선진 산업 중에서 다시 유망한 50 개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70%는 자동차, 컴퓨터, 우주항공 등의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고 30%는 소프트웨어 산업, 서비스 산업, 에너지 산업이 차지하여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선진 산업들은 지난 30 여 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웃돌았고 다른 산업군들보다 고용 및 부가가치의 효과가 2 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일반 산업의 임금은 17%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선진 산업은 63%나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 년 동안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부터라도 미국 선진 산업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경제를 이끄는 커다란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외부자금의 유입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셋째, FDI 의 적극적인 유치입니다. 내수를 활성화하는 일이 어렵다면 외부의 자금을 유치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외부자금의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FDI 를 주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하였고 FDI 를 유치하여도 될 만한 기반을 많이 갖추었습니다. FDI 를 경제 전반에 한꺼번에 도입하기 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도입초기와 달리 투자액이 많이 줄어들어 아직까지 미완의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보다 넓고 융통성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FDI 의 효과와 발전 추이를 살펴보면서 우리 경제에 차차 도입해 나간다면 소비를 증진시키고 내수를 살려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커다란 동력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의 성장률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을 모두가 주목하여 지켜보고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신창타이를 외치며 '뉴노멀'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조에 적응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글로벌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한 자세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벤처산업육성, 적극적인 FDI 유치를 이끌어 낸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선진화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⑰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점점 깊숙하게 빠지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2 년 2.3%, 2013 년 3.0%, 2014 년 3.3%로 3% 초반과 그 이하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이미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의 경제전망도 최근의 경제성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밝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제시했고, 글로벌 금융그룹인 HSBC 는 3.1%,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3.0%를 제시했습니다.

'언제쯤 이러한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대로가면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저성장을 하게 됩니다. 2031~2040 년 우리 나라의 잠재성장률 평균이 KDI 의 전망에는 1.9%, OECD 의 전망에는 이보다도 더 낮은 1.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이렇게 끝없는 추락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해결책은 바깥에 있는데 바로 외국인직접투자(FDI)입니다. 2013 년 기준 홍콩 720 억 달러, 싱가포르 560 억 달러, 영국 530 억 달러 등 선진국 중에도 FDI 유치액이 큰 나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은 FDI 를 바탕으로 성숙한 경제임에도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FDI 유치액은 100 억 달러 수준으로 이들 국가에 비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을 환영하는 나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홍콩, 싱가포르, 영국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 법인세율 인상이 논의 중인데 인상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법인세율을 높이자는 사람들은 우리와 경제 체질이 다른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옳은 방법으로 비교해보면 우리의 법인세율은 전혀 낮지 않습니다.

법인세율을 높였다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는커녕 지금의 우리 기업들도 해외로 나갈 것입니다. FDI 유치 대국인 홍콩은 16.5%, 싱가포르는 17%, 영국은 21%로 모두 우리 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습니다.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대만도 또한 17%로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둘째, 반기업 정서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14 년 상반기 기업호감지수(CFI)' 조사에 따르면 100 점 만점에 겨우 47.1 점으로 우리 나라의 반기업 정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도 올까 말까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에 올 리가 없습니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노동의 미래와 노동 유연성 보고서'에 따르면 107 개국 중 노동시장 유연성 70 위, 고용 유연성 86 위, 투입 유연성 51 위로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일삼는 강성노조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넷째, 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투자를 했다가 손해만 보고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냄새를 쫓아다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고 싶어할 곳이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가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인 FDI 유치입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기는커녕 토종 기업들조차도 견디기 못하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계가 글로벌 경제전쟁 중인 지금 자본에는 국적이 없어졌고 자본은 오직 돈 냄새만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돈 냄새가 나야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냄새를 맡고 자신들의 자본을 우리 나라에 가지고 올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돈 냄새가 나도록 고치는 과정은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칠 것이 많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치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개혁의 과정은 괴롭겠으나 그 결실은 굉장히 달콤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개혁을 통해 FDI 가 활성화된다면 외국인들과 서로 도우며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영국처럼 그 결실을 누리며 선진 대한민국의 건설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⑱ 임현수(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창조경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창조경제란 말 그대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슬로건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는 생산과 고용 등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규제여건, 생산비, 시장규모 등 국내기업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본질적으로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 그리고 이윤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유가치를 추구하는 건강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혁신적인 창조는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MWC는 전세계의 다채롭고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얼마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모바일 전시회 MWC 에서는 세계 정보기술업체 1900 여 곳이 새 제품과 기술들을 선보였는데요. 삼성, 애플 등에 못지않게 중국 업체들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혁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새로운 경쟁자 대열에 올라서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특정 업체가 특정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기업들이 경쟁자이자 동반자라는 인식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 MWC 에서는 대기업 외에도 벤처기업 90 여 곳이 다양한 스마트기기와 기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손에 꼽힐 정도의 기업만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입만 열면 규제 완화를 외치며 규제가 한국경제를 망치는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작년 세계은행이 189 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세계 5 위에 올라 있습니다. 창업과 건축 인허가, 자금 조달, 통관행정, 세금, 퇴출에 이르는 기업 활동 전 과정을 평가한 수치입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응당 바로잡아야겠지만, 경제 활력이 떨어진 이유를 막연히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주객전도이자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 수출 증대에 의존해 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장기적 전망에서 새로운 공정 개발이나 부품소재기업의 신설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를 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공계의 연구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창업 여건의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필자는 상생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불교의 공(空)사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경제를 포함한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도 행위의 주체는 결국 인간이고,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아닌 정신입니다. 공(空)이란 비어 있는 것이며,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자성(無自性)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변적인 사물과 지식은 무자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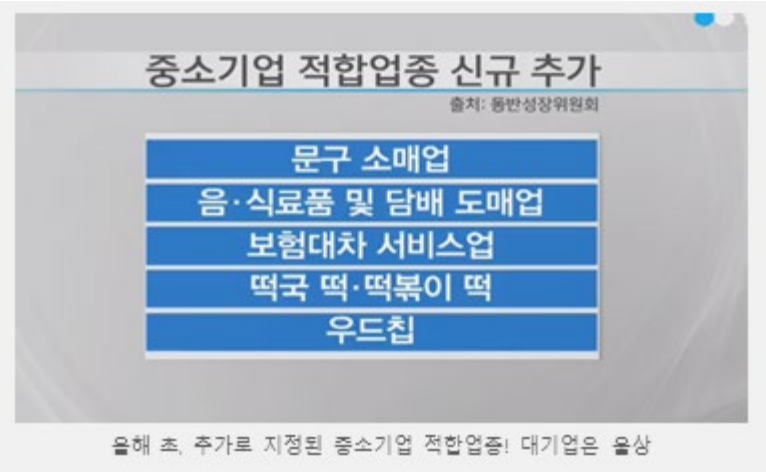
자신을 주장하지 않기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가 곧 타자이며 타자가 곧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빛은 어둠에 의존하여 성립하므로 절대로 어둠과 별개로 독립 자존하는 것이 아니듯, 사회의 그 어떤 경제 주체도 상대방과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을 위주로 압축성장의 가도를 달려왔다면, 이제 창조경제를 창달하기 위한 새로운 지향점은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꾸리는 일이 아닐까요. 과거의 후진적 갑을관계는 상생이 불가능할뿐더러, 이제는 소비자들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선진창조경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기업들이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림 2: http://telecoms.com/

⑲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근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신규품목을 지정했습니다. 적합업종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3 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됩니다. 눈여겨볼 점은, 새로 등록된 5 개의 분야에 '문구소매업'이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과의 마찰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대형마트에서는 문구세트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급작스럽게 판매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네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착한'명분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대기업에게 '또 다른 규제'로 다가오게 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논의는 몹시 중요합니다. 사실상 국내 기업 수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인 실정에서 기업생태계를 위해 중소기업의 생존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역할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중소기업의 보호가 대기업에게 규제로 다가가지 않아야 발전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이렇게 복잡미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속에서 정부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하나라고 봅니다. 바로 '경쟁하라, 생존하라'입니다. 경쟁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자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에서 생존해온 많은 기업들이 지켜온 신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이 경쟁없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거슬러가는 역주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하였지만 결국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재래시장은 거의 성장하지 못했으며, 대형마트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온라인 쇼핑몰이 차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누구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정한 상생을 원한다면 중소기업이 떳떳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중소기업은 불가피한 자본차이 때문에 대기업에 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어차피 대기업 경쟁제한으로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을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에 투자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싶다면 재래시장을 발전시켜주어야 합니다. 재래시장에 주차장, 깔끔한 환경,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지어주고 고객을 유치하여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아닌 '재래시장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항상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도 용인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최소한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지요. 그 이후 레이스를 펼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에 기여하는 역할이 필요할 뿐,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에 대해 한 가지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힘을 낼 수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강한 분야에는 주로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을 대기업이 따라가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술에 대해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열어주어 중장기적으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의해 강소기업들의 기술발전이 더뎌지는 사태가 없도록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정부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대기업보다 힘을 낼 수 있을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시행한다면 얼마나 그 시장이 성장할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누구도 웃지 못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이전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더욱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생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위해 '바람직한 수단'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시장경제체제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야를 넓혀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는 확실히 중소기업에게 보장해주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이로써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복잡미묘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진경제의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1) https://www.youtube.com/watch?v=OzdaXqA810E

⑳ 조아라(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창조경제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우리 경제는 노동, 연금, 가계부채 등 여러 분야에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낮게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이로 인한 고용문제도 대한민국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 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국내 진출 외국기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첨단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외투기업을 유치해 국내기업과 융복합을 이뤄 혁신적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경제 실현에 외투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한국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크게 부진한데요. 그 이유는 예상가능한 투자환경 구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하기 좋은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상가능한 투자환경'이 이뤄져야 합니다.



예상가능한 투자환경은 외국기업 유치에 중요한 요소!

외국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임을 고려했을 때, 매년 바뀌는 정책 환경은 곧 사업환경이 매년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적 정책으로 사업환경의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외국기업의 유치에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외국기업 유치관련 정책입안의 예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업들의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정책입안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실제 이해관계자들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입법과정에서 입법자문위를 만들어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방법은 정책입안에서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국제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만약, 외제차와 관련된 입법이라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과 해외 자동차 기업 등의 실무자들을 자문위로 선발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진출해있지 않은 해외 자동차 기업에게 우리나라가 입법하려는 법안을 들고 가,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법이 어떠한지,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들은 우리나라에 진출을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방법도 해외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규제개혁에도 예상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사실 정책 예상가능성과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입니다. 정책이 예상가능할 정도로 일관적이라면 앞으로 어떤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지 국내외 기업인들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개혁을 할 때는, 규제의 수보다는 규제철폐가 가지는 영향을 검토해 그 영향력이 큰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국민과 기업가들, 해외 기업들이 생각하고

체감하고 있는 규제의 정도나 문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보제공'의 필요성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외국인 패널들이 호소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이나 규제 등 여러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입장과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통의 부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부정책의 PR 전략이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 미디어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다채널, 다매체를 사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일관된 정책과 규제개혁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내외 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는 한 번에 바뀔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문화와도 직결이 되는데요. 바로 장유유서, 군대식의 상하관계와 소통문화의 부족에서 오는 창의력의 한계입니다.

과거 한창 창조경제의 붐이 불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츠파 정신'에 집중한 바 있습니다. 지위의 고저와 상관없이 효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도전정신이 후츠파 정신의 기초입니다.

우리네 젊은이들이 이러한 정신을 본받고, '예측가능성'과 같이 국내외 기업들이 함께 기업하기 좋은 토대가 이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선진화된 창조경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3월 18일, 제 1차 선진화연구모임이 개최되었다.

김수빈(서울대 언론정보 2):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연구모임에 참가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거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은 훨씬 상승하였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출근에 매일 같은 야근을 겪고 있습니다. OECD 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지만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상위 50%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증가시킬 지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공지예(서울대 언론정보 2):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기업은 근로자에게 시간의 자율성을 부여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원이 아침 9 시에 출근해서 6 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하고, 매일 지각한다면 이러한 그 사람의 신체리듬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원(서울대 언론정보 2): 만약 회사가 회사원 모두에게 다른 근무시간을 주어야 한다면 이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김수빈(서울대 언론정보 2):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유한킴벌리라는 기업이 시행한 '시차출퇴근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오전 7~10 시, 오후 4~7 시 사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권리'를 직원들에게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에 출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직원이 아이를 유치원에 여유롭게 등원시키고 출근할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유연한 노동시간은 무리겠지만, 이처럼 2, 3 시간 정도의 제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지은(서울대 경제 2): 기업이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흔히 연봉서열식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외국 기업은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오래 있다고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좋은 결과물에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빈(서울대 언론정보 2): 저도 이러한 말에 공감합니다. 무조건 근속년수를 따져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노동이 조금 더 유연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인환(서울대 언론정보 2): 저는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어느 학과를 나오든 비슷한 기업에 취업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뜰에(서울대 정외 2): 만약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을 가졌을 경우 4 년이라는 시간을 직업교육에 직접 쏟을 수 있는 반면에,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관성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이 시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달인'처럼 타인의 직업을 존중하고 자신의 기업에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배인환(서울대 언론정보 2): 어떤 기사를 보면, '대학 교육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대학의 직업교육은 감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실질적인 직무교육을 하던지, 아니면 전공을 살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원(서울대 언론정보 2):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모든 것을 대학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대학은 학문을 공부하러 가는 곳인데, 너무 취업 준비를 위한 학과 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바로 취업해서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이스터고 등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교육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은(서울대 경제 2): 저희 집이 울산에 있어서 중공업 단지 등의 전단지를 많이 보는데, '고졸 환영' 등의 포스터를 자주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대졸자를 불리하게 본다고 해요. 고졸이라 속이고 들어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졸 사원이 오히려 퇴사 위험이 적다는 등의 현실적인 장점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꼭 이러한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기업에서도 직업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대졸, 고졸 가리지 않고 선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뜰에(서울대 정외 2): 또한 직업마다 존중해주는 문화가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은 너무 대기업 중심적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배관공이나 식당 주인이 사무직보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박진원(서울대 언론정보 2): 그 말씀을 들으니 생각났는데, 저번에 어떤 교수님께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직업이든 자신이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갈고 닦기만 하면 자신도 달인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직업을 존중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면 좋겠습니다.

김수빈(서울대 언론정보 2):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기업 내의 수직적 위계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과도한 위계로 인해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상사의 의견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결국 창의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화가 아직도 존재할까요?

배인환(서울대 언론정보 2): 최근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는데요, 그러한 위계적 사례가 드라마 내에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질서가 존재하니까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주인공의 심정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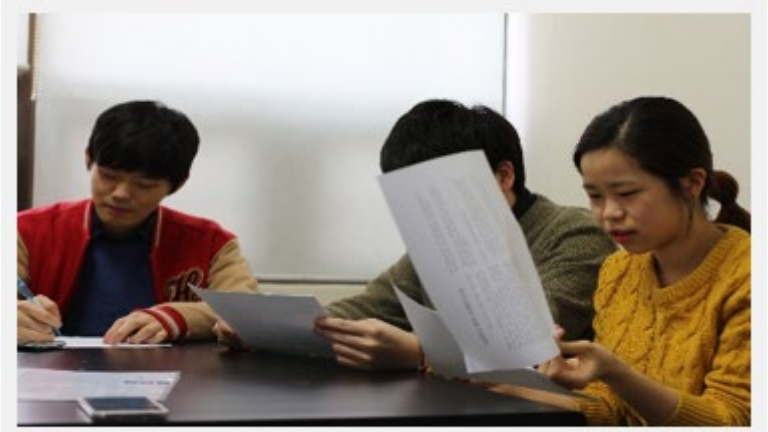
공지예(서울대 언론정보 2): 대학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모임을 해도 고학번 선배에게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따르는 문화가 많습니다. 아직 토론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업을 들을 때도 토론식보다는 강의식이 더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질문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안뜰에(서울대 정치외교 2): 아직 이런 폐쇄적인 문화가 아직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식 수업의 증가 등을 통해, 직급에 관계없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빈(서울대 언론정보 2): 네, 감사합니다.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았는데요. 노동시간의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제, 학교 내에서의 실질적 직업교육에 대한 강화, 개인의 직업과 장인정신에 대한 존중, 기업 내 수직적 위계질서의 타파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토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1차 선진화연구모임이 열렸습니다.

박소정(서울대 사회복지 3) :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창조경제 실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창조경제는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창조경제의 핵심 기반 중 하나이자, 잠재적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청년 벤처 창업 육성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지금 현재 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지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허소담(서울대 사회복지 3) : 청년 벤처 창업이 잘 안 이뤄지는 이유로 가장 먼저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성공한다는 가능성도 적고, 실패했을 때 위험부담이 너무 커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우리 사회가 우선 대기업 위주인데, 창업을 한다 하면 작은 규모일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안정적이며 위험부담도 덜하고, 금전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선향(서울대 중문 4) :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소담(서울대 사회복지 3) : 사회적 인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잘해봐라 하고 인정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으며, 쟤는 취직이 힘드니 창업하나 보다 하는 시선도

있어서 창업하기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아직까지 청년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비전 있고 멋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게 창업을 막는 요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원(서울대 정치 3) : 국가적으로 창업률이 낮은 것은 사실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용 없는 성장의 하나의 대안으로 청년 창업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지, 청년창업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업을 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설립이나 세금 문제들을 배운 적이 없고, 알아보는 것이 막막해 힘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창업한 사람들 중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잘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탈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편하게 만들어야지 않을까 합니다.



박소정(서울대 사회복지 3) : 저도 창업을 하려는 과정에서 법인설립과정이나 세금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 절차를 맞추기 위해 고생했었습니다.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에는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강의도 하고, 지원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센터들이 더 늘어나고, 교육도 각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하고 학생들이 무조건 이수하게 하는 식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선향(서울대 중문 4) :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는 것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등을 약탈하고 소송을 길게 끌어서 중소기업을 죽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사라져야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박소정(서울대 사회복지 3) : 그런 의미에서 사업 분야 자체에 대한 특허도 확실하게 보장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업이나 사업 등에 필요한 창의성과 관련한 교육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이 잘 안 이뤄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 토론해 봤는데, 그렇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원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응백(서울대 경제 3) : 과제를 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찾아보았는데,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나 교육부 등등 수많은 정부기관에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도가 아예

미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중복되는 것이 많고, 홍보가 부족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서울대 사회복지 3) : 제도 자체가 많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지원 자체가 경제적 지원만 이뤄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창업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앱을 개발하는 기술 자체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미비해 결국 아이디어에만 남겨둔 적이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향(서울대 중문 4) : 교육 프로그램도 동감합니다. 저는 지원이 대부분 공모전차원이나 대출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공모전차원의 지원은 물론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소정(서울대 사회복지 3) : 저도 공감합니다. 이스라엘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니, 돈을 우리처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만 맞추면 돈을 사회투자의 측면에서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도 사회투자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허소담(서울대 사회복지 3) : 그런데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입장에서는 좋지만, 국가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재정적 측면에서 어렵지 않을까요? 적합하다는 선을 결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도 창업이 많이 이뤄지면 국가 성장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니, 창업을 지원하고 싶을 텐데, 재정적 부담 탓에 아무래도 잘하고 유망 있는 청년 창업 위주로 지원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무작정 사회투자의 측면에서 지원범위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응백(서울대 경제 3) : 공모전이 현실적인 스크린의 측면도 있으니, 공모전 형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소정(서울대 사회복지 3) : 현재 사이트에 자신이 기획하는 상품을 올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거기에 얼마를 투자해, 목표금액이 채워지면 사업에 투자되고, 사업이 성공하면 상품을 받는 지원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응백(서울대 경제 3) : 저는 그 제도가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결과물을 보고 지원하는 것인데, 창업을 하고 그 결과물을 바로 그렇게 넘겨버리면 초기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소담(서울대 사회복지 3) : 저도 그런 제도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런 제도는 결국 현재 잘되고 있는 사업에는 지원이 몰리고, 이제껏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블루오션같은 항목들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 투자가 적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동원(서울대 정치 3) : 저는 지원금을 소득과 자산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것이 결국 국가적 새로운 경제적 효과창출보다는 개인적 측면에서 사회이동성, 계층 이동성이나 사회재분배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런 자산이 부족하니,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소득과 자산규모에 비례한 지원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응백 (서울대 경제 3) : 소득이나 자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사업 아이템의 가능성을 일 순위로 두고, 그 다음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창업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서울대 사회복지 3) : 지원 프로그램의 중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기술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자. 지원금 제공 시 소득과 자산도 고려하자 등의 방안이 오늘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제시됐습니다.

이 의견들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토론자들께 감사하며 이것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지방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모여주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 '서울 외의 지방 지역의 외국인투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지구의 바이오, 의료 산업 단지와 같이 지방에도 충분히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과는 다른 충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활성화 이외에도 전반적인 지방경제 발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발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수(고려대 식자경 2): 그렇다면 저는 지방 지역의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의 큰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수도권 지역과는 다른 지방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 지역의 '축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일본 오사카 지역의 눈꽃축제,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와 같이 축제를 활성화시킬 경우 그 지역의 관광산업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외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역 축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 홍보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나 지역축제가 유명해지면 외국에 우리나라 지역에 대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홍보는 외국인투자유치에 발판이 될 수 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지방의 경제도 살리고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어 매우 좋은 방안인 듯합니다. 외국인투자유치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바로 홍보입니다.

한국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 있습니까?

전찬우(고려대 식자경 1): 지역 축제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봄에는 진달래꽃 축제, 벚꽃 축제와 같이 꽃을 주제로 한 여러 축제들이 지방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축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맡고 또한 지역 축제도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축제 홍보를 위해서는 많은 수단이 이용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TV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1 박 2 일과 같은 국내여행을 테마로 한 예능프로그램과 같이 이러한 TV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축제 및 관광정보를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SNS 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봄에 꼭 가봐야 할 명소들', '벚꽃 축제가 열리는 곳'과 같은 게시물들이 페이스북 등 여러 SNS 등을 통해 올라오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지역관광산업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준원(고려대 식자경 1): SNS 를 통한 홍보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SNS 를 잘 활용한 예시로 고양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시는 지역홍보를 위해 특정한 컨셉을 잡고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에서 올리는 이러한 홍보 게시물들은 기존의 진부한 홍보물들에서 탈피하여 접근성의 편리함과 독특함을 통해 여러 네티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성공적인 홍보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지역홍보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저도 실제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부산의 명소들 중 감천마을을 방문하였는데요, 감천마을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표적인 지역명소가 되어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를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홍보가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작 지역 내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있지 않다면 외국인투자유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투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심준원(고려대 식자경 1): 지방 지역의 투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인프라와 같은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인적자본, 주변 산업체들 간의 연계 등 수도권 지역이 이미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지역이 수도권 지역보다 더욱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는 다른 특징적인 메리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오송 바이오, 의료 산업 지구와 같이 특징적인 메리트를 잡아주어야만 지방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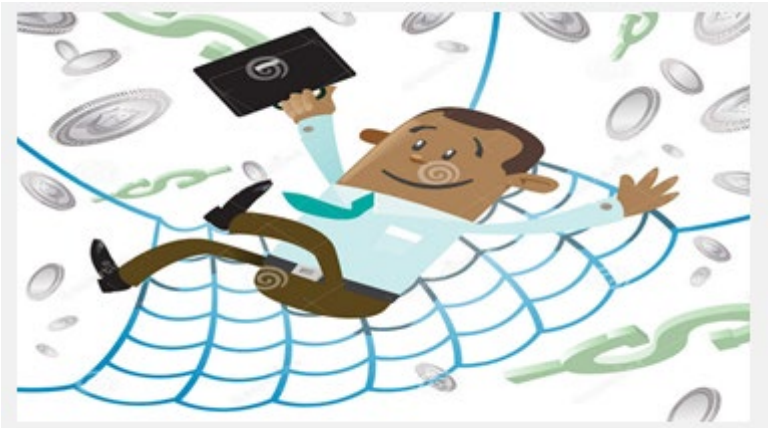


지방 투자처들은 수도권 지역과 차별되는 특색을 갖추어야 한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좋은 의견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테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송 지구와 같이 지역 투자처들이 특징적인 테마를 갖춘다면 투자유치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툴루즈 지방에 바이오테크 및 화장품 산업지구들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활성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도 지역들에 여러 특징적인 산업 테마들을 잡아주어 일정한 경제 지구를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찬우(고려대 식자경 1): 이를 위해서는 월례토론회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던 지역생태계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역들이 갖추고 있는 지역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준수(고려대 식자경 2):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역생태계를 중심으로 테마 지구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창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먼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지역경제만이 아닌 한국 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일 것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힘든 이유는 많은 한국 국민들이 안정적인 직장 취업에만 목을 메고 창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산업들이 주류가 되고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창의적 마인드를 창업으로써 현실화시키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암울한 상태에 놓일 것이고 외국인투자자들도 이러한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창업에 도전하여 실패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또한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지용(고려대 식자경 2): 지방지역 투자 활성화와 한국 전반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역 경제 테마 구축, 창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등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방지역 투자 활성화 및 창조경제의 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제 1 차 고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모임에 참여하신 학우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제 1차 선진화연구모임이 열렸다.

윤수정(연세대 정치외교학) : 지금부터 신촌 지역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어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성공적으로 발굴해 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처산업 육성과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가 부진한 점을 감안, 지난 2 월 26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창조 경제 실현과 외국인 투자기업 -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요.

특히 청년창업 활성화가 이번 정부의 벤처산업육성정책의 주요 현안 이슈로 이미 각 지역에 지역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엔젤펀드 지원제도 등 다양한 정책들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20 대 대학생 청년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만들어지고 또

운영될 수 있는지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공감 가는 이야기들로 함께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들과 또 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업 실패에 대한 청년들의 두려움과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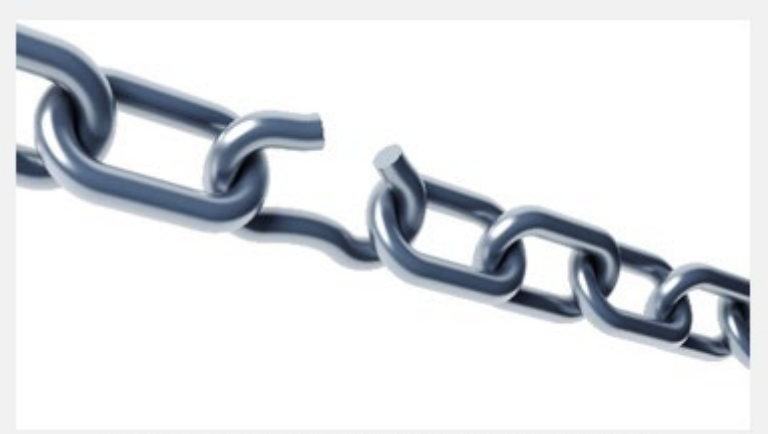
권용우(명지대 생명과학정보): 저는 사회의 청년창업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창업을 한다는 부담감이 크고,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높은 보수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이 보장되는 게 중요한 인식이다 보니 요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공기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창업의 경우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받는 지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빚을 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한 빚이 시작에는 2~30%에 불과하지만 만일 창업 과정에서 잘못하면 70%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빚덩이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청년들로 하여금 섣불리 창업에 뛰어들기 힘들게 만듭니다.

중국이나 유럽의 창업 활성화 정책을 벤치마킹 한다고 해도 이러한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대학생들 스스로의 인식을 제고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와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지연(이화여대 의류): 저도 그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의류학과는 여타 과들에 비해 창업에 있어 조금 특성화된 면모가 있는 케이스인데요. 학과 수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패션 브랜드를 다루다 보니 관심이 생겨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친구들이 동기에도 많은 편입니다. 스스로 웹디자인을 배워서 사이트도 만들고요.

무엇보다도 소비자에 대한 구매력지수, 선호도나 시장 조사를 하는 활동이 동반되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전공과도 연관이 되고 특히 하나의 스펙으로 인정이 되어 창업이 실패하고 다시 취업으로 돌아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창업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오히려 창업에 한 번쯤 도전하는 게 좋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창업 실패 후 찾아올 수 있는 경력단절의 위험도 큰 문제다.

하지만 다른 과들의 경우 취업이 실패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경력인증이 안 되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을 지거나 자본금을 회수 못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경력이 단절되어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점이기에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망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세희(연세대 경영): 경영도 취업 스펙의 하나로 벤처학회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순히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만 반짝 활동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원 제도는 지원금이 모자라서 라기 보다는 지원을 받아 출발한 벤처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 사회문화적으로 창업에 대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는 사실상 실패가 목적인 사업인데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2 등만 해오면서 세계경제를 따라가는 입장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상 현재는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기업들의 노력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1 등의 자리를 지키며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뒤따라가는 문화가 너무 굳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불고 있는 인문학 붐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그런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은주 학우가 말한 것처럼 사전적인 지원보다는 사후적인 금전 보상, 특히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연세대 언론정보): 저 역시 스타트업 프로그램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단순히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창업이 실패했을 때 보상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강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창업을 주제로 다룬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창업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합적인 창업 공간을 마련해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청년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난감한 요소 중 하나가 돈뿐만

아니라 바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오피스 공간이 없다는 점인데요.

벤처창업 스타트업의 경우 소규모 인력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 하나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큐에서는 큰 오피스 하나를 잘게 나누어 공유하는 창업공간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보여주면서 이런 제도가 창업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공간 공유제도가 경쟁률이 너무 쎄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 구상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창업 공간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신지연(이화여대 의류): 저는 원천기술을 배우거나 개발하고 특허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현장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제시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학과 커리큘럼들이 현장 실무에 대비된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인문학적인 교양을 풍부하게 배워갈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 것도 아닌 모호한 상황입니다. 대기업 취업 목적 일변도에만 맞추어진 잘못된 교육 커리큘럼을 바로잡아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세희(연세대 경영): 저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실제 기업에서는 C 언어를 쓰지 않는데 공대에서는 C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리큘럼은 단순히 창업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장 실무와 동 떨어져 현실에서 써 먹을 수 없는 학과 수업은 사실상 죽어 있는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수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학 커리큘럼 역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와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많은 창조혁신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창조혁신센터가 오성, 광주, 창원 생명과학단지와 같이 지방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방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 창업 활성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창조경제를 골고루 육성하겠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연구 R&D 의 경우 지원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만약 창업 정책이 지방에서 활성화 될 경우 수도권 학생들 또한 필연적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방에 내려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까요? 또 반대로 지방 학생들 또한 과연 창업 거점을 지방으로 잡고 싶을 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인재매칭프로그램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 POOL 이 있어도 그것이 연결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재매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지연(이화여대 의류):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저는 많은 정책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인재매칭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 게 분명 몇 가지 정도는 있을 텐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유명무실한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참여유인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윤수정(연세대 정치외교): 네, 끝으로 덧붙이자면 창업의 활성화 정도는 결국 정보력의 차이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들이 창업 자체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지원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극명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하다 보니 창업 활성화에 있어 대학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특히 주요 창업 특강들이 유수대학에만 몰려 있는 현실을 적극 개진하여 지방 대학들 또한 질 좋은 창업 프로그램과 특강을 많이 유치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촌 지역 학생들의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실질적인 창업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같은 20 대의 시선에서 바라본 만큼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하나 하나가 모여 한국 사회의 선진화와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여해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이것으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8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제 1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했다.

이정진 (국제관계 3) :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벤처산업 육성과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 월 26 일 한국선진화포럼은 '창조경제 실현과 외국인 투자기업 -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각 지역에 지역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외국인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지역경제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학생의 역할은 무엇인가?”로 소주제를 잡았으니,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미흡한 홍보에 대해 집중하여 대학과 정부적 차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홍보대사 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보다 많고 다양한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보대사 활동을 겸함으로써 지역 대학생들을 활용한 좋은 홍보 방법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시훤 (국제관계 3) : 창조경제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이티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세계적 경제 추세를 보았을 때, 소프트 산업 계열을 성장시키려는 움직임 즉 창조경제는 옳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육성시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은, 벤처를 하겠다는 청년들이나 창업을 하려는 기성세대가 '이 산업을 육성시켜 해외 투자를 증진시키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겠다.' 라는 위험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지역 대학생으로서 원주 그리고 강원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활성화시키려면 지역에 머무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대학생들이 지역에 남아서 혁신센터가 활성화되느냐 혹은 지역경제혁신센터가 잘 운영 되어서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대사 혹은 아카데미를 통한 활동은 전자와 후자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될 것입니다.

김세원 (국제관계 2) :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목표 중에서도 창업 허브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경제혁신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가적인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창업과 대학생의 기업가적 문화 정착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혁신센터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아직은 6 곳에 불과합니다. 일단적으로 지역에 혁신센터가 있어야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을 그 지역의 인재로 활용하려면 그에 맞는 기관이나 시설이 갖추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황주영 (국제관계 3) : 더하여 저는 각 지역의 특수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산업이 중요하다고 하여 IT 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주는 군사도시로 손꼽히는 만큼, 군사분계선을 이용하여 군사 특성화 도시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각 대학에 군사학과를 만들거나 하는 방향으로 지역이, 그리고 지역 대학생이 가진 특수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공학부의 경우 아시아 최초로 진행되는 의료기기태크노밸리 사업 하에 많은 지원을 받으며 원주를 의료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적 특색을 이용한 정부 주도의 산업으로 지역 대학생들을 양성하고 인력으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황제 (국제관계 3) : 저는 실제로 창업 공모전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학우들은 공모전에도 정치적 흐름이 있어 이를 따라야 수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전자담배를 장려하는 시기에 전자담배에 관한 아이템을 통해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을 받기 위한 선발 과정 또한 이와 유사하게 정치의 흐름에 따라가게 된다면 참신한 아이디어는 묻힐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 대학생으로 중요한 것은 대학끼리 연합하는 싱크탱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원주캠퍼스에는 의공학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소재의 대학에 의공학부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는 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위해 의공학부를 늘리고, 대학의 학생들은 대학 간 연결, 협력을 통해 의료 기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방향으로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교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생적으로 의견 교류를 하고 모임을 만드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학 내에서 대학생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학생들을 끌어 모아 진정한 지역적 허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황주영 (국제관계 3) : 이황제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대학생들의 창업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일과에 시달려서 도피처로 선택한다거나 '창업이나 하지'라는 식으로 창업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튼실한 중소기업, 대기업을 보면 누구도 우연히 창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의 부사장의 경우 석사 학위만 6 개에 달합니다. 이는 학위가 창업의 보증수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곳의 정보를 통해 깊은 통찰력을 쌓아야 좋은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학위가 담고 있는 의미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며, 대학과 정부에서는 이러한 올바른 창업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진 (국제관계 3) : 지역 혁신센터의 활성화를 지역 대학생이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생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창업과 창조경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기회 같습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토론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선진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④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

김다혜 :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학기 중에 바쁜 시간을 내어 토론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성장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국가 정책 중 하나가 창조경제 실현인데,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잘 실현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기업이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의 원인인데요. 각자 자신의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한 발표를 해주세요. 오늘 토론은 찬, 반의 기존 토론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SAID 토론모임 학생들과 1차 연구모임 진행

박현승(이대 대학원생) : 지난 2 월 매일경제에 실린 기사를 보았는데요. 외국인 기업의 시각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생산성이 저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를 보면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 떠올랐습니다. 노조 천국인 영국에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법과 원칙을 사용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적인 규제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서강대 철학) : 일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놓고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가 심하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정규직만이 살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잘못된 의식에서 출발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OECD 국가 중 포르투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요, 따라서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다은(동국대 경영):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킨다고 하죠. 그렇지만 지난 2006 년 비정규직 철폐를 실시한다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늘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는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완화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철현(대학입시 준비생): 현재 많은 아웃소싱 회사들이 노동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죠, 이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비용이 적게 들어서 이윤이 생기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복지 등 보장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 퇴직금조차 받기 어렵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적인 규제 필요성

양정호(대학입시 준비생): 저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노조의 세력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약 1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다른 나라의 노조들과 다른 성격을 띠어 강성노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노조 파업은 시장경제를 마비시키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법파업이나 노조전임자 급여 등과 같은 불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다혜 : 네, 좋은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 노사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 진행했던 정책이 좋은 사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강성노조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임금체계를 근무시간보다는 성과에 근거한 보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승(이대 대학원생) :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기업의 노사문제를 보면 일단 정규직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이 책정되어 있어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의 임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실제 비정규직이 반발을 할 요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규직의 임금을 낮추고 특히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부터**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정호(대학입시 준비생) :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경우 우리나라만큼 파워가 강한 노조가 없죠, 하지만 기업도 노동자들의 임금 안정, 일한 시간에 대한 올바른 보상,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일부 기업들은 시간 수 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기업들도 윤리적인 경영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 원리에 대한 기본 교육의 활성화와 시민 의식의 증진

김다은(동국대 경영) : 3 월 22 일자 인터넷 기사에 어느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더군요. 현재 물가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부진한 것은 맞지만 경제가 침체되어가는데 임금만 올려놓는다면 어떤 사장이 고용을 늘리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정치인들의 무식하고 얕은 경제상식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경제 원리 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서강대 철학) : 일단 임금이 상승하면 물가도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저의 생각으로는 노조가 정의를 실천하는 단체인 듯 생각하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언론들이 여기에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부추기죠. 따라서 **언론의 올바른 정보 전달하기** 켐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장이 많죠.

이철현(대학입시 준비생) : "무슨 일하세요?"라는 흔한 물음에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입니다."라고 대답하기 두려워하죠. 이는 시민들의 의식이 고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불쌍한 시선, "너는 미래가 안 보이는구나...."이렇게 생각하는 관점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시민의식의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김다혜: 네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하나의 단계가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이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직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결 방안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와, 강성노조에 대한 법적 규제의 마련, 기업가들의 윤리적인 경영방식 필요성, 정치인들의 경제 원리 교육, 언론의 올바른 정보 전달,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 등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2차 월례토론회에서 창조경제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을 가지고 논의함.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정부가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투기업과 정부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부터 먼저 함께 생각해봅시다.

제 생각에는 그들을 연결해줄만한 매개체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고 어떤 점을 서로 협력해 나가며 도와줄 수 있을지 연결해주는 창구가 없어서 지금과 같은 소통의 부재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외투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안일한 태도로 겉으로만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은혜(이화여대 교육 2): 저도 그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가 주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의 경제는 급성장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가 경제에 많이 관여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의 후유증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현재의 관료주의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심수영(이화여대 교육 2):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싱가폴에선 최근에 다국적 기업에 대해 개방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를 40%에서 4%로 낮추는 등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죠. 덕분에 다양한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팽배해져 있는 관료주의 때문에 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유진(이화여대 교육 1):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만들어지는 정책들을 보면 상당수가 친기업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느 정도 친기업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와의 소통이 없는 상황은 아닌 것 아닐까요?

이은혜(이화여대 교육 2): 그러한 정경유착적인 측면과 소통은 엄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 법이 나오게 된 거 아닐까요? 물론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강력하게 정경유착을 막자는 측면에서 말이죠.

이지은(이화여대 교육 1): 그 법이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졌을 수는 있지만 부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무언가를 대접하는 것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기업과 정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 있기론 그 자리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오고 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김영란 법이 적용되어서 그 자리 자체를 막아버리면 소통이 더 단절되지 않을까요?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의 취지는 살리되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진 학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기업에게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도 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기업 분포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은 적은 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기업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까지 아울러야 하는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소통이 끊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수빈(이화여대 교육 1): 저는 다른 식의 발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도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관련 정책 같은 것들이 영어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만 설명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브로슈어 같은 것을 만들 때에도 영어 번역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만 배포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제대로 알아듣는 데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자꾸 변형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바뀌는 우리나라 정책들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맞추는 것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정책을 지속해서 이 어려움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전달되는 책자가 한국어로만 되어있다는 사실은 처음 들어보네요.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정부와 외국인투자기업 간의 소통이 단절 되었으며 그로 인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학우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우님들의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정부와의 소통의 부족 이유는 말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이었습니다. 당연히 창조경제를 표방하려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이나 혹은 그들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청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간담회에서 외투기업이 포함된 다양한 기업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방향을 서로 소통하는 길이 외국인직접투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은혜(이화여대 교육 2): 대신 그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벤트성으로 잠깐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해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우린 이렇게 간담회하고 소통을 한다'로 전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 수확 없이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배수빈(이화여대 교육 1):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책을 만들 때에 있어서도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강할 때만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유진(이화여대 교육 1):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보를 알려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기업에서 정책이 바뀌면 알아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먼저 정책을 바꾸고 나면 관련 기업들에게는 브로슈어 등을 만들어서 알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인터넷 신문고와 같은 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방법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시스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 정부와 기업들이 소통.

이지은(이화여대 교육 1): 요즘 sns 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과 정부 역시 sns 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사항들을 말하는 등이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소통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혜(이화여대 교육 2): 아니면 소통을 담당하는 기구를 따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계속 바뀌고, 대통령의 입김이 너무 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약에 맞추어 정책들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독립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소통 문제뿐 아니라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유진(이화여대 교육 1): 아까 이윤진 학우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그렇다면 기업들끼리 회의를 한 결과를 그 기구에 보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외국기업들끼리, 중소기업끼리, 대기업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후에 그 회의 결과를 관련 기구에 피드백으로 보내는 거죠.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각 기업에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정부부처에 파견시켜서 정부정책 만드는 데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유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조유진(이화여대 교육 1): 하지만 그러기엔 기업의 숫자가 너무 많고 또 모든 기업이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성연(이화여대 교육 1): 저도 문제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또 다른 것은 정책이 좀 길게 연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5 년 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진(이화여대 교육 3):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정부와 기업이 소통할 수 있을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sns 나 인터넷 신문고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도 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거나, 혹은 정해진 정책들을 정부가 기업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식의 방법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기구를 만들어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통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듣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은 소통의 창구들이 조금 더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⑤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준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 월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창조경제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 9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토론 도중 우에노 후지 제록스 사장이 뜻 밖의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 조언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청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청년층이 살아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민 (동주대) : 학벌의 폐해는 결코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학벌과 관련한 한국의 사회제도가 잘못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사회제도는 명문대 위주의 대학 시스템입니다. 명문대 위주의 대학시스템을 프랑스식 대학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학벌의 폐해가 완화된다고 봅니다.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다음은 박진호 학생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개선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진호 (동아대 국문학과) : 지방과 수도권을 비교할 경우 수도권은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도 잘 살펴보면 수도권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질 수 없는 고유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 고유의 자원을 특화 시켜서 지방 교유의 경쟁력을 키우고 특화된 자원을 앞세워서 발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수도권이 대기업이면 지방을 히든 챔피언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이동건 학생이 생각한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건 (동아대 국문학과) : 네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년의 취업난해소의 관점으로 볼 때 **첫 번째로** 직업서열화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만 미국은 덜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재로는 핀란드의 교육방식을 빌려와서 창의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고

세 번째로는 정부차원의 일인데 미국의 실리콘벨리나 중국 상해, 싱가포르 같은 곳의 투자환경, 즉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한 벤처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보다 발달한 가장 큰 이유가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할 때 이게 투기성 자본으로 투자 못하도록 몇 년 동안 강제로 잡아두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중국 경제발전의 동력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들을 제어 못해 국부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업은 외국엔 싸게 파는데 국내에선 비싸게 파는 일이 많습니다. 내수에도 좀더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국제적인 관계로 보았을 때 구 식민지에도 경제적인 영향을 강하게 주는 영국처럼 대외 무역 역량도 대한민국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지는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와 태평양권의 관계를 강화해서 외국과의 교역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규제할 건 규제하고 확대할 건 확대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해결책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까?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우린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대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시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김승우 (사회인 20 살) : 경력직의 비중을 줄여주고 정규직 신규채용을 늘려야 합니다.

김혜민 (동아대 경영학과) : 국가장학금의 수혜범위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기존의 국가장학금을 제 1 장학금으로 두고 제 2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전용으로 제 3 장학금을 성적 위주의 기준으로 지금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장학금 제도가 추가돼야 한다고 봅니다.

박진호 (동아대 국문학과) : 국내의 여건으로는 창의적인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는데 그로 인해 외화유출은 물론 인재유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FAU 처럼 외국교육기관을 지방에 유치하여 인재도 키우고 국부 유출도 막고 지방도 발전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건 (동아대 국문학과) :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최저임금을 13500 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현 최저임금으론 먹고 살기 힘들며 물가인상까지 반영할 경우 13500 원이 적정한 최저임금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 최저임금을 고정시키지 않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물가가 오르면 그에 따라 최저임금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눈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고용유연화는 솔직히 경제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측에서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을 평준화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말 그대로 서울대, 부산대, 동아대 다 똑같은 대학교로 만들어 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은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도권에 집중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예를 들어 부산출신 학생이 서울생활하면서 드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만 줄이더라도 상당한 절약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평준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학력에 의한 취업이 아닌 능력에 따른 취업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평준화는 필요합니다.

박진호 (동아대 국문학과) : 다 좋긴 해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입니다.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동아대의 가치가 1000 조원이 넘어가고 다른 사립대학교도 동아대 만큼 하거나 더 많을 것인데 진짜로 가능합니까?

이동건 (동아대 국문학과) : 프랑스 같은 경우 국유화가 되고 대학진학률이 65%~70% 사이입니다.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95%에요 그런 것 자체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겠죠 사립대 입장에선 학생을 돈으로 보는 그러한 현상들도 비교를 해봐야... 사실 제가 사립대를 다니고 있지만 사립재단이 가진 이점보다 사회적인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은 선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호 (동아대 국문학과) : 독일은 대학을 잘 안 갑니다. 안 가도 잘 사는 이유는 대학교를 안 나와도 충분히 자신이 활약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대한민국도 독일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오늘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취업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안정된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효과는 있더라도 컨트롤을 못 하면 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연구모임이 정부에게 제안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국가장학금을 확대해서 수혜자를 늘려야 합니다. 둘째 소수의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비정규직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셋째 대학 평준화는 어려워도 어느 대학을 나오든 대학 때문에 취업이 발목잡히지 않도록 법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지방만이 가진 잠재력을 개발하여 수도권 사람들이 관심 가질 정도의 메리트를 만들어야 한합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투자는 좋으나 주도권을 유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제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승찬 (동아대 경영학과) :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징기스칸의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충을 나누는 자리가 많아지면 해결을 위해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생각들이 해결을 위한 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⑥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한준(공주교대 4) : 지금부터 KELF(Korea Economy Leaders Federation) 한국경제리더연합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기 초라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모임 에서는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어떻게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창조경제의 올바른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유치를 하고, 그 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투명성이 낮고, 일시적이고 파행적인 정책운영은 외국기업들의 장기적 투자 및 유치의 큰 장애물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성(서강대 경제 2): 외국기업을 유치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창조혁신센터의 효용성에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들은 창조혁신센터에 대해 기대는 많지만,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기영합적 정책남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벤처창업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 메리트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영준(시립대 경영 3):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집행과정이 불투명하다. 우리나라의 CPI 지수는 40 위대로 낮습니다. 불투명한 예산집행과정과 정책의 불투명성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얻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배은성 학우가 말한 대로 창조혁신센터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감이 높고,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낮다. 정책의 불투명성에 따라 낭비되는 예산도 많고, 사업이 확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산이 들어오고 나오는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한준(공주교대 4) : 배은성 학우와 황영준 학우께서 우리나라의 정책 투명성에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정책 투명성은 외국인 투자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일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게 공개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오반석(명지대 경제 3):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해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요인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제까지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그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규제를 철폐하기만 해도 외국인 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 벤처기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김한준(공주교대 4): 이제까지 정부정책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벤처산업에 대한 경영적기반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안정된 정책과 규제 개혁을 통해 벤처산업을 일차적으로 육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기업들이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유다희(명지대 경제 4) : 창업을 하는데 초기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을 부담할 수 없어서 벤처에 대해 시도하려는 문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자본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임희선(홍익대 경제 4) : 사람들의 인식이 실패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평생 낙오자가 된 것처럼 취급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통해 그 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고,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형균(고려대 경영 2) : 창조경제를 외치고 벤처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정부정책들이 단기성에 치우쳐져 있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없이는 창조경제도 외국인투자 활성화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벤처육성을 활성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한준(공주교대 4) : 프랑스의 경우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육성하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 창업 및 육성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기 보다는 외국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자문을 해주거나 기획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실효성과 신뢰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유경훈(인하대 경영 4) : 실리콘벨리와 우리나라 벤처의 차이에 대한 LG 성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벤처의 경우 해외 투자 및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보스포럼과 같은 국제회의나 전시회에 참여 시키는 등 벤처기업들이 외국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오반석(명지대 경제 3) : 저도 유경훈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엔젤투자마트를 통해 투자유치 및 투자자의 기업발굴 통로역할이 필요합니다. 투자기회 제공이 필요합니다. 투자기회 제공이 있어야 해외직접투자와 외국기업의 벤처육성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우 외국기업의 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국내에 진출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페널티를 주거나, 인력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영준(시립대 경영 3) : 그 밖에도 외국기업과 벤처기업이 연계해서 외국기업 인재들을 벤처기업에 보내서 현장을 체험하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들을 외국기업에 보내서 기업문화 및 시장을 체험하도록 해서 인재를 순환시켜서 기업의 노하우 및 기업문화에 대한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김한준(공주교대 4) : 우리나라 벤처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창업을 주저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재기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엔젤투자마트나 그린필드, 핀테크와 같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황영준 학우의 경우 외국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인적교류 및 현장체험 기회를 강화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요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외국기업의 투자를 통해 어떻게 하면 벤처육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희선(홍익대 경제 4) : 외국기업과의 인적교류나 현장체험 외에도 자본이나 설비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합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우 연구나 생산, 마케팅 등 개발 및 경영, 판매의 전반적 과정에서 생산시설이나 설비 그리고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생산시설이나 설비 그리고 연구장비 등을 대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벤처육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황영준(시립대 경영 3) : 벤처의 경우 지적재산권이나 기업소유권 등에 대한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출혈경쟁이 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보호보다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한준(공주교대 4) :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계 기업이나 벤처기업 종사자들에게 정책의 변화와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벤처육성의 측면에 있어서 외국계 기업의 투자가 단순히 외자유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들의 창업가능성을 높이고, 재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멘토이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KELF 한국경제리더연합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⑦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원광대학교에서 제 1차 선진화연구모임이 열렸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지금부터 원광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내세웠으나 창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외투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에 불구하고 한국의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크게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난 2 월 26 일에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창조경제구현과 외국인투자기업,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모임은 창업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창업환경 조성에 있어 인식의 변화는 정말 중요하다

제 생각을 먼저 말하자면 창업환경 조성에 있어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여 실패 시 너무 많은 리스크를 창업자 본인이 다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줄여나가야 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창업환경 조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희주(원광대 국제통상 2) : 우선 창업환경 조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식과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왜 안 하려고 하나?' 생각해보면 굳이 위험부담이 많은 창업하는 것보다 위험부담이 적은 취업이 안전하다는 생각과 창업 시 아무런 시장조사 없이 창업하는 경우 많아 시장파악 실패로 창업실패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진 것도 큽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 방안의 모색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배상경(원광대 국제통상 4) : 저도 이희주 학우 말에 동의하며 내용을 보충해 말하자면 창업에 대한 자금부족과 창업에 대한 무지가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 낸다는 점과 한가지 더 이유를 들자면 대기업에 치우친 정책들과 구조가 창업을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 생각합니다.

최민정(원광대 역사교육 3) :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창업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자금이 많이 들고 창업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1998 년 IMF 이후로 창업보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된 것도 원인이 되었고 지금의 창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기술을 베끼는 사람만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식변화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인식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원광대 국제통상 2) : 우선 시각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홍보가 너무 빈약합니다. 광고를 한다든지 신문 등으로 꾸준한 광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광고비용이 엄청나니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배상경(원광대 국제통상 4) : 광고도 좋은 방법이지만 국가가 지원한다 해도 한계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광고보다도 서포터즈의 활성화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서포터즈나 홍보대사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고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고 홍보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 벤처 기업들이 서포터즈나 홍보대사 활동의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저도 배상경 학우의 의견을 좀 보충하자면 요즘 현 시대의 화두 중 하나가 SNS 즉 소셜네트워크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홍보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 아직도 중소, 벤처기업들이 SNS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변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이번엔 직접적인 창업 유도의 창업환경 조성 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원광대 국제통상 2): 창업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많은 창업자금입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법적인 창업지원 장치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상경(원광대 국제통상 4): 저는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창업교육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카페에 10 개가 생기고 있으며 10 개가 망하고 있다 합니다.

현재 20~30 대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에 뛰어드는데 의지와 열정만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민정(원광대 역사교육 3): 저도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약간 주제와 떨어져 보일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은 틀에 박힌 교육으로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창의적인 생각을 키워주기 힘들며 직업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률이 갈수록 떨어지지 않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도 창업환경 조성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즈마 펀드 같은 제도로 이스라엘은 창업의 나라가 되었다

배상경(원광대 국제통상 4) : 창업의 나라라 불리는 이스라엘을 예를 들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요즈마 펀드라는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정부에서 리스크도 같이 부담해주며 창업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창업의 나라가 될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제도를 하나 만들어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형(원광대 국제통상 4) :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은 창업환경 조성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해보았고 인식변화 방안과 직접적인 환경조성 방안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창업환경 조성은 창업이 활발한 국가들을 모티브로 삼아 장점들을 수용하며 우리나라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⑧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1차 선진화연구모임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 창조경제 실현을 국가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되지 않아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소주제로서 “세계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도 충분한 경쟁력과 매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를 정해 보았습니다.


인재양성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대한민국의 현행 교육방식은 주로 암기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해력과 응용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입식교육이 아닌 토론식 수업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수업 분위기도 개선되어 의견을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야만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홍익대 토목공학): 박현진 학우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태인이 토론식 교육시스템이 잘 되어있는데,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험상 수업시간에 아예 질문을 하지 말라는 교수님도 있었고, 분위기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서 질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이정아(숙명여대 영어영문학): 대부분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저는 수업시간에는 강의를 충분히 듣고, 수업시간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을 가져본 후에 의문을 갖는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을 정리해서 나중에 물어본다면 질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대한 기본 생각은 박현진 학우와 동일하지만,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하자면,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한 교사에 할당하는 학생 수를 토론수업에 맞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 수준에 맞게 작은 반을 구성하고 토론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토론을 함에 있어서 부담도 줄어들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홍근(홍익대 도시공학): 저도 경험상 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얼마 전까지 수업을 들었던 대학교육에서도 주입식교육 위주의 수업방식을 겪어왔는데, 이로 인하여 스스로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앞으로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이를 통해서 분명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저는 현대의 '아산서원'과 같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기업 차원에서 활발하게 열어준다면, 기업도 자신의 회사에서 꼭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고, 학생들도 비용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한 교육시스템이며 대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주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김정환(홍익대 토목공학): 현재 기업에서 인재양성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대학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학교육이 충분히 잘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정아(숙명여대 영어영문학): 저는 대학교 때에 인문학 학과이어서 그런지, 토론식 수업을 많이 해서 대학교 때에 정말 크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취업을 하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고 큰 학문을 배우는 곳인데, 요즘 세태는 대학을 취업을 위한 통과의례라고 여기는 듯 합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수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홍근(홍익대 도시공학): 저도 기업에서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본 적이 있지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여 보통의 대학생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활용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우리나라는 똑똑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핵심적인 창조경제의 인재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고시나 국가공무원시험, 또는 대기업 등으로 몰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직업이 아닌, 이미 갖추어진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청년창업이나 연구개발에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홍익대 토목공학): 우리 또래 인식이 첫 직장을 이름 있는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대우를 많이 받기 때문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아서 더 대기업을 가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인력 낭비입니다. 이상적인 취업의 모습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중소기업에서의 실무경험을 쌓고,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아(숙명여대 영어영문학): 김정환 학생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복지와 대우에 대한 정부지원과 보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 면에서 근무시간, 보험, 급여에 대한 안정이 필요하고, 보호 면에서 중소기업 자체 기술 특허권을 대기업에 빼앗기지 않게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 대기업-중소기업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아닌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홍익대 도시공학):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부당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창의력을 요구하는 벤처창업 등에 지원한다면 분명 창의력을 갖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현진(홍익대 도시공학):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 이렇게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대해서 우리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토론의 기회에서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⑨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단국대학교에서 제1차 선진화 연구모임이 열렸습니다.

백송희(단국대 무역 2) : 지금부터 단국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구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전국 17 개 창조혁신센터를 활성화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뿐 아니라 각 지방에 클러스터를 형성해 경기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지방 소재 대학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여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로 오려는 인재들이 지방대학에서 공부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에 대한 유인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수진 (단국대 무역 2) : 저는 백송희 학우의 의견에 반대로 혁신센터에 금전적 지원 등의 많은 지원을 해주어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 많은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단위, 예를 들어 '시'나 몇 개의 '군' 단위로 클러스터로 묶어서 지방의 특색을 살린 테마를 세운 후 창조혁신센터와 손을 잡고 산업과 문화 등에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혁신에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혜선 (단국대 무역 2) : 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힘든 이유가 진입장벽이

높다는 데에 깊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오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송희 (단국대 무역 2) :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같나요?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문혜선 (단국대 무역 2) : 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들을 한국 기업에서 등록금을 면제해준다거나 일정금액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예 국제 학교나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한솔 (단국대 무역 2) : 문혜선 학우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의견을 추가하자면 서울의 이태원처럼 그들만의 문화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시설 및 건물의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이태원을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초등학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지방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주 (단국대 무역 2) : 저는 외국인 기업의 먹튀논란을 바라보면서 이런 데에 대한 법적 제도를 잘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는 게 맞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내에서 신뢰를 얻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기업이 먹튀하지 못하게 막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진 (단국대 무역 2) :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만큼 지방에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도 산업단지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어째서 인재들이 수도권만을 선호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창조혁신센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박한솔 (단국대 무역 2) : 지방에 기구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일을 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행정서비스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구의 분산이 보다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단국대 무역 2) : 그렇다면 반발이 너무 심하지는 않을까요? 세종시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힐 것 같은데요.

윤수진 (단국대 무역 2):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등의 큰 기구뿐 아니라 공원 등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여 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에 주택을 많이 만들고 상수도 시설을 재정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희주 (단국대 무역 2): 지역 사회 및 창조혁신센터에 투자할 때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예를 들면 거주 년도를 기준으로 기관의 유인책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거주했다면 그 지역의 특색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창조혁신센터에서 인센티브를 주어 채용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한솔 (단국대 무역 2) : 위에 윤수진 학우의 말에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이유로 정치인들의 무한한 포퓰리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정치인들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외면한 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내세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생각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목 놓아 외치는 데에 비해 뚜렷한 경제 문제 해결 방안을 실현하여 성과를 내세우지 않는 지금 상황이 조금은 벅차게 느껴집니다. 창조경제라는 말이 너무나도 추상적인 범위이기에 정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백송희 (단국대 무역 2) : 창조경제란 쉽게 이야기해서 창업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청년들의 벤처창업을 기반으로 외국인투자시설을 유치하여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구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목적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에 많은 인재를 유치해야 합니다.

박한솔 (단국대 무역 2) : 저 역시도 창업의 중요성을 느낀 게 제가 1 학년 때 들었던 경제학원론 교수님도 항상 청년들의 창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대학 교수마저 창업의 중요성을 역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딛고 일어 설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은홍 (단국대 무역 2) : 저도 박한솔 학우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뉴스에서 창업한다고 노력하였던 사람들이 4 학년에 올라와서 결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기업 입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뿐 아니라 대학에 만연한 기업 입사 풍조가 한국의 현실을 조명한다고 생각되어 매우 씁쓸합니다.

박한솔 (단국대 무역 2) : 우리나라 사람들도 창업을 기피하는 마당에 외국인들이 과연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박한솔 (단국대 무역 2) : 그렇기 때문에 지방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욱 알리고 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창조혁신센터가 존재하고 있고요.

김민경 (단국대 무역 2) :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부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되어 지방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인들 역시 정권에 따른 포퓰리즘이 가득한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주 (단국대 무역 2) : 저는 중소기업 진흥센터와 창조혁신센터를 연계하는 것도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진흥센터와 창조혁신센터가 협력하여 외국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유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진 (단국대 무역 2) : 중소기업에 인재가 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인재들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멘토링 및 재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학과인 무역학과 주임교수이신 정윤세 교수님께서는 전자무역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아직 중소기업은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창조혁신센터에서 교육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혜선 (단국대 무역 2) :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지가 좋은 중소기업들의 사이트를 모아다가 홍보한다면 중소기업에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창조혁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송희(단국대 무역 2) :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자, 외국인투자기업이 잘 유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자 등의 방안이 오늘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제시됐습니다.

이 의견들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토론자들께 감사하며 이것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⑩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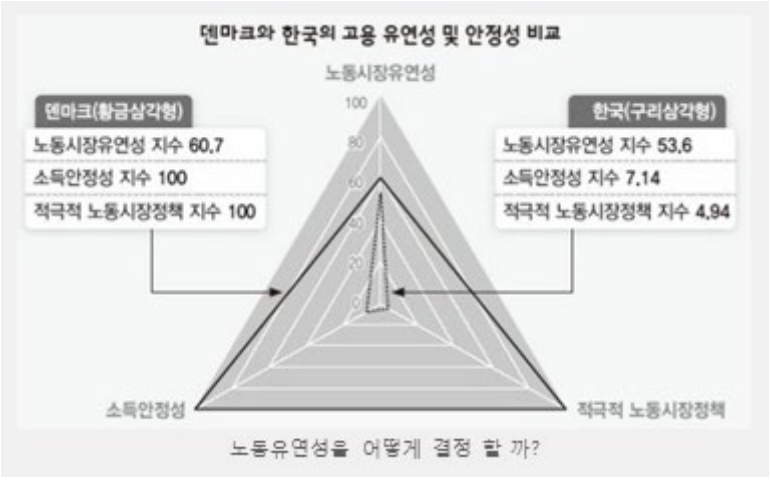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FDI유치 확대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해줄 것이다.

송민상 (중앙 정치 3)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1 차 중앙대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셔 매우 감사합니다.

이번 제 1 차 중앙대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한국선진화포럼 주관으로 지난 2 월 '창조경제 실현과 외국인 투자기업 :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를 주제로 실시된 월례토론회와 관련하여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이 전환점을 찾기 위한 국가 정책 중 하나가 창조경제 실현인데, 그 성과가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외국인 직접투지 유치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경제를 구현을 위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환경 조성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관해 폭넓게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정성원 (중앙 물류 2) :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 필연적으로 안전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준규직'의 방향처럼 완충지역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서 비용이 더 들어가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호길 (중앙 전전 3) : 완충지대를 만들기 보다는 정규직의 과보호 현상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환경을 살펴본다면 고용의 유연성 확대를 정책으로 고정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고용의 확대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해고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하며, 정규직의 철밥통을 깨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해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현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서 인식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혜원 (중앙 중문 3) : 정규직의 철밥통을 깨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급자의 부재를 하급자가 무조건 대체하는 식의 승진문화가 아닌 동일 직종의 경력자가 임무를 대체하는 식의 문화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력 유연성 확보를 위해 프리랜서 방식의 근무환경의 확대 및 정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선민 (중앙 중문 3) : 기업의 호봉문화도 개선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의 호봉을 베이스로 한 임금 지불이 아닌 정규직의 성과제 시스템 정립을 통한 임금지불로의 방향 전환을 통해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지음 (중앙 영문 3) : 성과제의 적극적인 도입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며 기업의 경영 상황에 맞게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이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유연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고용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국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되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은 직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 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까?

송민상 (중앙 정치 3) : 소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턴 주요 논점을 전환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축소(비정규직 처우개선) 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김선인 (중앙 중문 2) : 과거 IMF 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 했는데 그 결과로 현재 비정규직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문화를 격파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시 되야 할 것입니다.

정성원 (중앙 국물 3) : 비정규직에 대한 무분별한 해고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수당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내 경쟁이나 일정 기간의 경과로 인해 성과나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원금이나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혜원 (중앙 중문 3) : 다양한 사유로 쉬고 있는 전문인력, 고급인력의 재고용을 국가 차원에서 매칭 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해고 시 동일 직종 계열로의 재고용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문적인 헤드헌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사 화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까?

송민상 (중앙 정치 3) : 끝으로, 노사 상생문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중앙 중문 3) : 지금과 같이 정규직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끝없이 들어주기 시작하면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만 악화시킬 뿐 유럽 문화에서 태생된 노조의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노조의 방향성을 비정규직을 포함한 보호받지 못한 집단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청업체를 대기업의 소위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호길 (중앙 전전 3) :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교육과정에 노사 간에 입장을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진학 과정에서 약 70%의 학생들이 실업계 학교나 생산직 노동자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고학력 노동자에 대한 엘리트의식이 현저히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고학력에 대한 엘리트의식 개선 및 진학 과정에서의 다양한 진로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성원 (중앙 국물 3) : 앞선 의견들에 덧붙여 공익광고 등을 통해 노사 간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한국의 특유한 노조 문화를 생각해볼 때 국가적 차원의 노동자에 대한 복지 확대와 기업에 대한 신뢰 재고를 통한 노조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선결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노조의 필요성 자체를 종식시켜 나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유창 (중앙 중문 2) : 결과적으로 유망 기업체에 대해 국내/국외 기업을 가리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가 된다면 FDI 의 유치 역시 적극적으로 적극 실현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의 거대 자본 기업들이 국내에 유치됨으로써 국내에 있는 포화상태의 미고용 인력들의 고용률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완화,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연계수요 증대 및 이로 인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해고 불안감 감소 및 노조의 감소로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민상 (중앙 정치 3) :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며 대학생들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한 FDI 투자 유치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⑪ 서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송소담(서경대 공공 4): 지금부터 서경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경제는 현재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창조경제실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경제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책투명성 저하가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번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정책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보다 잘 반영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더 잘 반영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보다는 정치인들의 의식개선과 시민단체의 책임감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현재 정치인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처우 개선이나, 개인의 목표 달성을 정책방향으로 잡아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결정 단계에서 비공식적인 참여자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다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시민단체 인사들의 참여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들이 정책결정 단계에서 '들러리'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진정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더 잘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는 정치인들의 의식개선과, 정책결정 단계에서 비공식적인 참여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서경대 경영 3): 저도 시민단체나 정치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 시민단체나 정치인의 의식이 개선되려면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정치인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식개혁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미희(서경대 공공 3): 저는 정책결정 단계에 있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싶은데, 현재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국민들이 정당이나 시민단체 참여를 통하여 정책결정 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나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소담(서경대 공공 4): 저도 정책결정단계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 합니다. 조미희 학우의 의견을 들으니 최근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을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할 것이라 기대되는 방법이 구성되었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읽은 것이 떠올라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바로 ‘정부 3.0 주민참여 정책마당’이라는 것인데요. 국민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정책에 잘 반영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더 잘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박준희(서경대 경영 3): 국민들이 정책을 제안한 경우나, 혹은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할 경우, 이것이 반영이 될 때, 국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이 되었으며,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메뉴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러한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였고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분기마다 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이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를테면 택배가 오는 것처럼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송소담(서경대 공공 4): 지금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기 위한 의견으로 ‘정치인들의 의식개선과 시민단체의 책임감 강화’, ‘의견수렴 정도와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알려주는 시스템 도입’이 나왔고, '정책결정 단계에 국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반영하는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희(서경대 공공 3): 저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국민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 이는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소담(서경대 공공 4): 저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를 위해서 대학생들이 각종 시민단체나 구청에서 제공하는 정치관련 강좌를 일정 시간 들으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이 그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대학교가 사회봉사과목을 도입하여 일정시간 봉사를 할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대학생들이 봉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워지죠.

박준희(서경대 경영 3): 저는 교육이 이러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을 어릴 적부터 배우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미희(서경대 공공 3): 저는 교육 측면에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발적인 발표를 많이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굳이 나서서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는 바로 '비난하는 문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를 했을 경우 비난하기보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수진(서경대 공공 3): 저는 이를 일반 국민 차원이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자들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기업은 여전히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직급에 따른 회의가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익명이 보장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소담(서경대 공공 4):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정치의 학점화를 통한 정치에 대한 관심제고', '교육을 통한 자발적 참여 촉구', '교육을 통한 발표하는 습관 형성', '유연한 기업분위기 조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낮은 정책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더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⑫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정우재(파이낸스경영 3) : 지금부터 한양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 월 26 일에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창조경제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재능, 창의성을 발현시키고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안정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병든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한 '개인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의 잣대와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상하간 도전이 불가능합니다. 계급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마인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업에 한 번 실패를 했다고 해서 실패자로 낙인찍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성공의 기준을 다양화하여 재능과 창의성,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민지(철학 4) : 한국인들의 안정지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매력적인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것의 어려움의 해결책을 3 가지 제시하였는데, 모두 구체적인 해결책이지 않고 문화문제를 해소하는 것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상하간에 도전이 불가능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 것은,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유교 문화에 대해 알지 못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나의 꿈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청년들을 전공이나 진로에 대해 선택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도전의식 발휘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방해하는 교육제도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국어국문 1)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육제도의 변혁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학생들은 초, 중, 고 전반에 걸쳐 대학 입시만을 목표로 하는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90%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고, 그 과정에서 한국 학생들은 대학 입시 이외의 분야에서 개인의 창의성이나 잠재성을 발현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한국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제도 아래서 사회의 일반적인 틀을 벗어나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중고교 내내 대학을 목표로 했던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는 취업을 또 다른 당연한 목표로 생각합니다. 제도권 교육의 획일적인 목표 강요가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제도의 변혁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학 입시를 위한 획일적 교육이 아닌 다양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목표로 하는 주입식 교육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야 개인의 창의성도 발현할 수 있다.

정경안(파이낸스경영 3) : 청년들이 자기 꿈을 찾고 좀 더 다방면의 생각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토론 문화를 학교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우리 교육의 주소는 한 명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방식은 과거 프로이센에서 생산직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낸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벤처마킹의 좋은 예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브루타라는 관습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둘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토론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스스로 질문하는 기회를 자연스레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토론이 활발했던 나라입니다. 일례로 조선시대 퇴계 이황은 기대승이라는 젊은이와 함께 자신의 사상과 그의 생각을 교류했습니다. 그들의 나이 차이가 20 살 이상인데다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 토론을 통해 공부를 하는 문화가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상하간 예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우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를 통해 비단 유교문화의 영향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토론교육을 활성화한다면 젊은이들의 창의성 발현, 자기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유정(철학 4) : 저는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로 창조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 역시도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만 알고 있지 정확히 '창조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정책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원한다면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해 없이 창업을 부추기는 행위는 결국 근시안적으로 단기간의 지원만을 받고자 창업을 시도하는 창업자들을 생산해내며,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사회에 그 어떤 기여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정우재(파이낸스경영 3) : 개인적으로 저는 '창조경제'라는 말이 창업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많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주입식 교육과 처음부터 길이 설정되어 있는 학업때문에 개인의 재능과 창의성을 발현하기 힘드므로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어 토론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는 동시에 창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성민지(철학 4) :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서 자본과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 청년들이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창의적인 마인드와 도전의식을 함양하지 못하여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 벤처기업을 창업하겠다는 많은 청년들의 자질에 대한 점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며,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안(파이낸스경영 3) : 21 세기의 가장 큰 이슈 중의 대부분이 IT 산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산업은 이와 관련된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불리지만 이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로 인한 명성이지, IT 계열에 인재가 충분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또 요즘에는 IT 에 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간단한 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므로 IT 에 대한 교육이 인재양성과 청년의 다양한 컨텐츠 생성에 많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우재(파이낸스경영 4) : IT 와 관련하여 최근 핀테크 열풍이 거셉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이베이 등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카카오톡 역시 '카톡뱅크'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송금과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IT 업체들이 금융서비스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IT 에 대한 교육은 미래의 필수교육으로 지정될 필요성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정(철학 4) :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창조경제의 실현 즉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비단 정부의 정책 마련과 실행만이 아닙니다. 사회와 교육차원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싶다면, 단기간의 창업률, 취업률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입식 교육을 자제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틀린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다양성으로 받아들여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제적 마인드와 외국어의 구사력은 필수입니다. 더 이상 기업의 활동 시장을 국내로만 한정지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미국의 Facebook 과 Google 이 널리 알려지고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물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장점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어의 용이함도 그 한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한국어 중심의 상품이 아니라 다국어로 사용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우재(파이낸스경영 3) : 사회에 만연한 병든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인의 재능과 창의성을 죽이는 현 교육방식을 지적하고 토론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 창업을 위한 개인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해결책 등이 오늘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제시됐습니다.

이 의견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창조경제실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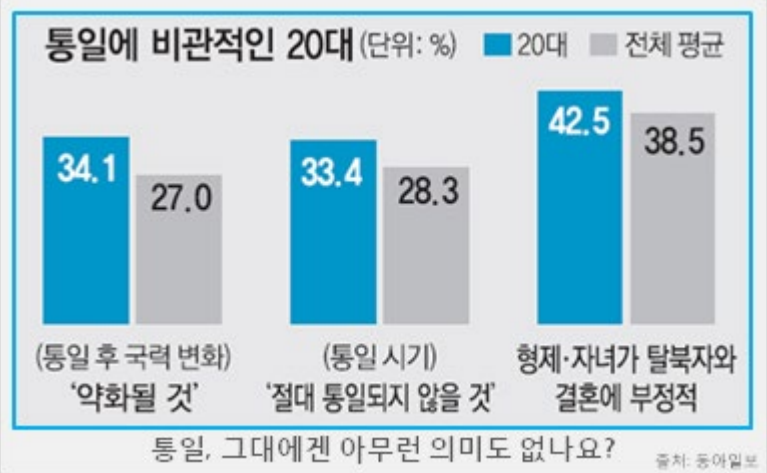
선진화 과제 35:

통일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제 91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류호영(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통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북분단을 겪은 과거 세대는 한 민족이고 한 나라였던 남북이 둘로 갈라져 사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여전히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교체된 세대들이 가진 통일의 당위성과 그 관심도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창간 93 주년 기념 통일 의식 여론조사 결과(2013)에 따르면, 20 대는 통일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가장 비관적이고, 30 대는 통일 준비를 크게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북한을 그저 '성가신 존재'나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인식하는 젊은이들이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통일의지와 통일역량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할 청년들이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희망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면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정적일까요? 역시 가장 큰 원인은 '통일비용'입니다. 남한이 세계최저개발국가인 북한과 합쳐지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말해주듯, 한반도 통일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 세계 리더이자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히든카드입니다. 저성장을 통쾌하게 깨부수는 생존전략이자, 세계일등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미래발전전략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 인구의 증가로 생기는 유효수요, 한반도·시베리아·유라시아 열차로 잇는 거대경제권이 통일이 가진 성장잠재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분단비용도 사라지며, 국론분열을 일삼던 종북세력이 없어지면서 쓸데없는 이념대립이 사라지고 순수한 진보와 보수만이 남을 것입니다. 즉 통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의 비용은 유한하나, 그 혜택은 무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 나서지 않는데 국제사회가 왜 통일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전 세대에 걸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국가정부는 통일을 대비한 국민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통일의 대상 즉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지식을 알리고, 통일 후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보도록 한다면 통일의식은 선진화될 것입니다.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그린 통일 애니메이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컨텐츠가 될 수 있는 “통일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귀여운 캐릭터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자연스러운 교육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컨텐츠입니다. 게다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친숙해하고 좋아하지요.

혹시 애니메이션인 '우당탕탕 아이쿠'를 아시나요? 충남경찰이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해 제작사와 협력해 만든 교육용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오는 충남경찰과 함께하는 안전교육 요청이 잇따를 정도로 어린이 안전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당탕탕 아이쿠에서는 지구를 처음 방문한 아이쿠 왕자가 지구에 적응하고자 안전지식을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연스레 안전수칙과 사고대처법들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일 교육에 있어서 애니메이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통일지식들을 전파하고 통일의식을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①분단되기 전 한반도의 역사: 일제강점기 이야기, 분단 이유와 그 과정 등.
②통일 전 남·북한: 쇠락하는 북한과 발전하는 남한의 대비, 국방비 과소모와 같은 분단비용, 천안함·얀평도 사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모습 등.
-북한: 굶주림과 핍박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 특색 있는 북한의 생활양식과 문화, 공산주의·사회주의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와 정치, 북한의 아름다운 자연풍경.
③통일 후 한반도의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 이산가족들의 감동적인 만남. 통일 후 경제·문화 발전. 통일 후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 한반도를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모습 등.

교육용보다는 ‘재미’와 ‘스토리’가 더 우선이 되는 장대한 통일국가 애니메이션이 된다면, 애니메이션 뽀로로나 타요 버스처럼 인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귀여운 3 등신 캐릭터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분단 전, 현재, 통일 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탐험과 우정, 성장스토리를 그려나가는 것이지요.

짤막한 시간 동안 딱딱하지 않은 내용과 앙증맞은 캐릭터로 통일지식을 전파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국가 통일정책 차원에서 실시한다면, 우리 모두가 통일에 대하여 여러 번 생각하게 되고, 더 친숙함과 필요성을 느끼며, 더 나아가 민족적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쉽고도 재미있게 퍼트리는 방법이 '애니메이션'이 아닐까요? 통일 애니메이션은 통일 전에는 통일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컨텐츠가 될 것이고, 통일 후에는 통일 전 모습과 그때의 노력을 알려주는 역사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말, 시인 이광수는 친일파로 변절하여 '독립무용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조국독립을 위해 싸우고 죽어가고 일제의 수탈에 신음하던 당시에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실에 안주했고 독립운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일과 비슷하게 엮어 생각해봅시다. 청년층의 통일의식이 둔화되는 모습이, 마치 일제강점기에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 일제에 순응하는 현실타협적인 시인 이광수와 같아 보이지 않나요? 즉 '통일회의론'은 곧 민족사를 외면하고 시대정신에 무지했던 '독립회의론'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이광수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독립투쟁하는 조선인들을 얻는 것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며 비판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독립했고 일본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독립을 외친 시인 이육사처럼 '시'가 되어도 좋고, 전 재산 팔아 신흥무관학교 세운 이회영·이시영처럼 '교육'이 되어도 좋고, 한 편의 글로 일제를 떨게 했던 신채호처럼 '글'도 좋습니다. 21 세기 감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서는 '애니메이션', '웹툰' 등으로 펼치는 통일운동도 매력적일 것입니다.

선진화된 통일의식을 갖도록 통일운동을 펼친다면, 분단의 비극을 느껴보지 못한 어린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가슴 벅차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통일운동을 해보는 것 어떤가요? 선진화된 통일의식으로 결국 하나 되는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모여 살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② 우동식(서경대학교 경영학과)



최근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통일’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숙원 사업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통일 의식을 선진화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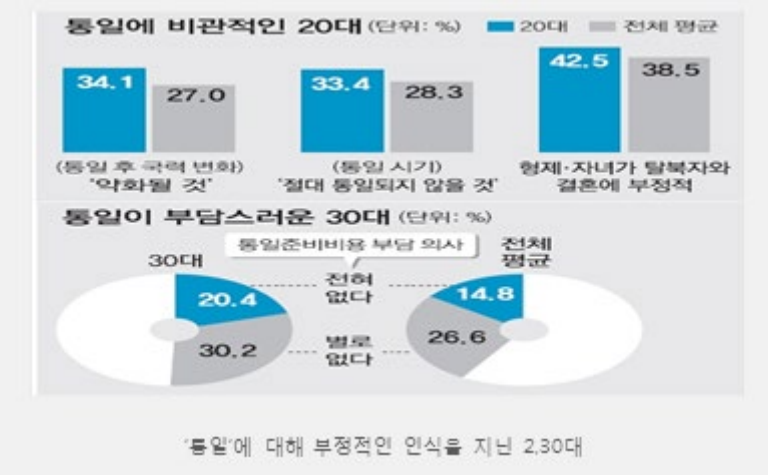
먼저, 통일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상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린 학생들과 2,30 대 청년들의 의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미래의 통일시대를 열어갈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30 대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통일비용을 비롯한 경제적인 부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북한 동포들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이 외국인보다도 먼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통일을 이끌어갈 주역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관과 민족의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제대로 알아야 국가관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설된 과정은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동시에 올바른 민족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통일’에 대한 과목을 신설하여 가르치는 방법도 논의해보면 어떨까요? 역사 교육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고 통일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예상성장률은 3 퍼센트 대 초반입니다. 중국은 매년 목표치인 7.5 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승승장구 하였지만, 올해는 6 퍼센트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저성장기조와 중국의 중성장기조가 뉴노멀로써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일은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저렴한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의 인건비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커다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 지역에 매장된 많은 양의 지하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은 10 억 t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0 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6 천 500 조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진 광물자원의 24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북한 지역에는 각광받고 있는 자원인, '희토류'가 4800 만 t 정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희토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희토류'는 반도체, 2 차 전지, 전자제품의 발광체, 기차, 선박을 생산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입니다. 몇 해 전 역사문제, 영토분쟁으로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일본에 대한 자국의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IT, 전자, 조선 산업이 발달한 우리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아연 2110 만 1000 톤, 석회석 1000 억톤, 마그네사이트 60 억 톤 등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그네사이트의 매장량은 세계 3 위, 흑연은 매장량이 세계 4 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의 절반만 북한 지역에서 조달해도 연간 16 조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요. 우리가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분명 다시 한 번 경제부흥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일'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세 번째, FDI 를 포함하여 많은 자본과 기술의 유입으로 다시 한 번 고성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을 비롯한 유수의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아 매년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 해 3 분기말을 기준으로 196 조 8000 억 원으로 우리 기업들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그룹 124 조 5000 억 원, SK 와 LG 는 60 조, 50 조 규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이 정도면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통일 이후, 이러한 엄청난 양의 자본이 북한지역에 유입된다면 매년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기업들의 생산능력과 자본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결코 어느 기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능력과 북한의 자원을 결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 파급력과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기업들에게 북한은 분명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통일'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

불모지에서 오늘 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한강의 기적'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저는 통일을 통해 제 2 의 '한강의 기적'과 같은 '통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주역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기적 시각에서 본다면 '통일'은 분명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멀리 보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에는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동북아경제권의 중심국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2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30402/54130944/1

③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동아일보의 창간 93 주년 기념 통일 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 대의 33.4%가 절대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34.1%가 통일 후 국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30 대의 50.6%가 통일준비비용 부담에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 년 통일의식 여론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 대 67%, 30 대 75%, 40 대 85%, 50 대 이상 84%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두 여론조사를 통해 젊은 층일수록 통일에 회의적이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의 이 여론조사에서 전문가의 68.6%가 통일이 최소 11 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식어있을 것입니다. 젊은 층의 의식을 바꿔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들이 통일의 주역으로서 앞장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통일을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까요? 그 이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통일과 선진화 국민의식 조사 및 2010 국가선진화지수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은 남북한 경제 격차 등으로 통일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 것을 크게 염려하여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통일비용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나라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20 세기에 통일을 한 독일과 베트남도 처음에는 통일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경제도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베트남은 통일을 기회로 삼아 크게 도약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우등생, 유럽경제의 엔진으로 불리며 세계 4 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했고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EU 의 버팀목 역할을 하여 EU 의 붕괴를 막아냈습니다. 베트남은 통일이 되고 개혁개방 정책이 펼쳐진 이후로 90 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 7%, 2000 년대 6%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국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은 도약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일과 베트남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들 국가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는 통일은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그 상황과 이익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종북세력에 의한 국론분열이 사라지게 됩니다. 종북세력들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시민단체, 정당, 노동계 등에 침투했고 이들은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시켜 왔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종북세력의 숙주인 북한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북세력들이 자양분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고 고사하게 됩니다. 종북세력들에 의해 발생하던 혼란과 낭비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단결된 대한민국, 더 효율적인 대한민국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쟁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군사도발을 일삼고 핵까지 가지고 있는 북한이 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망설이게 합니다. 통일은 이런 망설임을 사라지게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 한국의 12 대 유명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이 되면 현재 1200 만 명 수준인 관광객 수가 2020 년 최대 3000 만 명에 달하고, 지속적인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2050 년에는 2 억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을 손에 넣게 됩니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인 16 개 광물의 잠재가치는 2012 년 하반기~2013 년 상반기 국제거래가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5 조 7503 억 달러로 약 6000 조원에 달합니다.

우리 나라는 매년 400 억 달러가 넘는 지하자원을 수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한 마디로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만하던 우리 나라가 국산 원료를 가공하여 수출하기 시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인구가 늘어나고 젊어집니다. **골드만삭스**의 한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권구훈 전무가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통일금융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밝힌 분석에 따르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평균연령이 10 세 가량 낮아지게 됩니다.

또 5000 만 명인 대한민국의 인구에 북한 동포 2500 만이 더해지게 돼서 7500 만 명 가량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고령화 문제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해결되고 내수시장이 훨씬 더 커져서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경제가 내수와 수출이라는 양 발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반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이어져있으나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 대륙과 단절되어 실질적으로 섬나라와 다를 바 없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중국의 동북 3 성, 몽골, 시베리아로 진출할 수 있게 되고 대륙과 대양을 모두 우리의 앞마당으로써 이용가능합니다.

또 북한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문화, 경제,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EU 와 같이 강력한 동북아시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우리 나라는 그 공동체의 중심국가로서 세계에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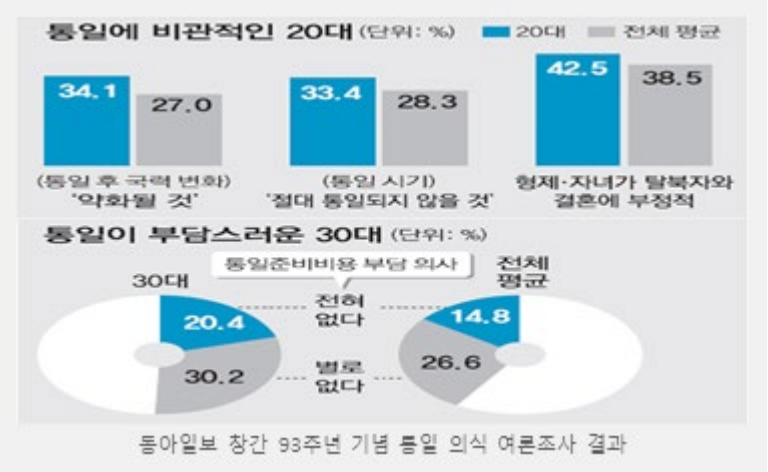
통일이 대박이라는 말은 전혀 과한 표현이 아니다.

통일이 주는 이익은 이렇게 너무나도 큽니다. 통일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21 세기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되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전혀 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통일의 이점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점점 식어가고 관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널리 홍보하고 특히 학교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 층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림 3 출처 : YTN 뉴스 캡쳐

④ 정복윤(고려대학교 정경학과)



최근 대학의 한 수업에서 '통일'에 관련해 학우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통일이 경제적 비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아일보 창간 93 주년 기념 통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경향이 한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20 대의 경우는 통일에 비관적인 경향이 있었으며 30 대 역시 통일준비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다른 국민연령대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통일에 있어서 '인식'은 몹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부족은 곧 통일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직 '한민족으로서의 당위성'으로만 통일을 바라본다면 실용적인 청년세대는 통일에 대해 흥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현재 통일에 대해 남한이 북한을 위해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역시 통일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통일이 한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통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통일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통일이 가져다 주는 밝은 미래를 위해 한국이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통일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통일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바라본다면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통일을 기반으로 모두 함께 경제성장을!

통일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사실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진 성장잠재력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북한의 잠재된 경쟁력을 통일을 통해 한반도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북한의 성장잠재력으로는 먼저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22 배 가량 많은 지하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는 2013 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약 7 천조에서 1 경 사이의 잠재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외국 자원에 대한 수입을 감소시켜 한국의 국제수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세계가 자원부족의 시대로 흘러가는 시점에서 한국에게 막대한 자원영향력을 부여합니다.

또한 북한은 값싸고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력은 교육수준이 높고 문맹률이 1%도 되지 않아 활용도가 큽니다. 이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죠. 또한 그 동안 제조업중심이었던 한국이 노동집약적인 상품까지 그 경쟁력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일로 인한 노동력 확보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륙열차로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된다

더불어 통일은 다양한 의의를 제공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종단열차와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도 있죠.

국경을 접하여 서로를 넘나들 수 있는 철도가 개척됨으로써 동북아시아가 하나의 지역공동체와 경제영토로 묶이고 태평양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시대에 한반도 초일류 국가라는 미래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통일 후에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종북세력'이 사라져 이념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북세력이 없어지게 된다면 진정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건전하고 순수한 진보와 보수만을 남길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은 분단 후 남한에 꾸준히 존재했던 이념문제를 해소하는 의의도 지닙니다.

게다가 통일은 국방과 관련해서도 이점이 됩니다. 먼저 한반도의 국방력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존 남북한의 군사가 통합되면 한반도에 2 백만 명이라는 군사력이 생기게 되며 이는 세계 2 위로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숫자입니다. 타국이 군사력으로 감히 쉽게 할 수 없는 정도의 위치를 통일한국이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육, 해, 공, 우주를 이어 5 번째 전쟁지대라고 불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사이버 군사력 역시 경쟁력을 지니게 됩니다. 북한에 존재하는 3 만 명이 사이버해커들은 미국 못지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쟁에서 사이버해커들은 적국의 전산통산망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맡아 전쟁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만큼 통일은 분명 국방력 강화의 긍정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시각을 넓힌다면 통일이 한반도에 가져다 주는 이점은 더욱 큽니다. 통일을 기점으로 북한 국민들의 유효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역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로 몰려드는 FDI를 기대할 수 있다!

이로써 한반도가 FDI(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활발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내적동력을 되찾은 한반도의 경제성장을 더욱 돋보이게 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북한지역을 경제특구로 설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글로벌 시대에서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북한이 남한만큼이나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장기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성장 동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세계의

헤게모니를 지켜왔던 미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진다는 회의론자도 속속 등장하며 폭발적인 성장률을 지켜왔던 중국도 성장률 하락으로 이제 7%의 성장률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렉시트(Greece+Exit)로 유로존도 불안정하며 저유가에 신흥국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일, 글로벌 한국이 되는 길!

이런 시점에서 한국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북한과의 통일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고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 역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시점에서 '한민족이라는 당위성'으로만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용적 사고방식을 가진 청년세대에게 경제적 관점으로도 통일을 바라볼 것을 제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바꾸어 차세대가 앞서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시 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그림 1) http://news.donga.com/3/all/20130402/54130944/1
그림 3) http://www.youtube.com/watch?v=-ZQ354ouSCY

선진화 과제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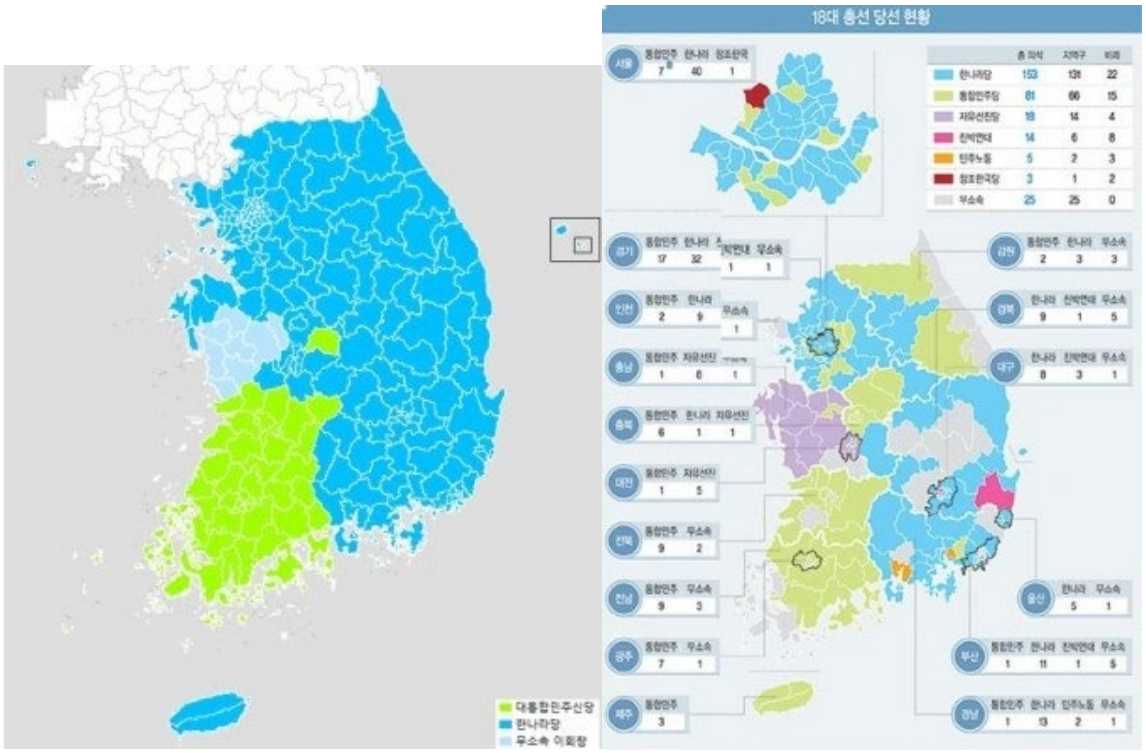
한국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과 진단

(제 63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권혁규(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4.11 총선에는 없었으면 하는 것 : 지역주의
4 월 11 일에 치러지는 19 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여, 야 모두 당명까지 바꾸고 저마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12 월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대 어느 총선보다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안 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역주의이다.



〈17 대 대선 투표 결과 : 제 17 대 대통령선거관리시스템〉 〈18 대 총선 투표 결과 : 문화일보 2008-04-10 기사 中〉

한국정치를 지배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 바로 지역감정에 바탕한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이다. 또 그 지역주의적 투표에 의하여 발현되는 지역구도이다. 선거판도의 대부분이 지역구도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특정정파의 특정지역 독식의 정치는 그 부작용이 크다. 지역별로 경쟁없이 선출직 공직을 독식하며 이권을 나눠먹고, 특정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가진 정파는 국민의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천장사를 하게 된다. 당연히 지역민의 이익이 침해받고, 정책경쟁이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질낮은 저질정치를 피할 수 없다.

전통적인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는 영호남 사이의 대립이었다. 그 연원을 삼국시대나 후삼국 시대까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한국정치를 지배하는 지역주의는 우리의 현대사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현대사에서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이 생기고 강화된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그 하나는 경제적인 구조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정치인들의 악행이다. 다시 말해 해안선이 단조로운 영남을 중심으로 공업입지가 발달하면서 한쪽은 피해의식을, 다른 쪽은 특권의식을 알게 모르게 마음에 품게

된 측면이 있고, 여기에 지역 맹주체제하의 지역정당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이 그것을 교활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증폭시킨 것이 더해져 오늘날까지 지역주의가 끊임없이 이어온 것이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지역주의 정치로 인하여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자기 지역 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사용하려는 후진정치를 하고 있고, 선거제도에서 알 수 있듯 지역주의 정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에 무슨 정책을 펴든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지역주의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한국정치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주의를 타파할 유일한 방법은 유권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지역주의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1 조 1 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 종국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독립적인 개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민 스스로가 구태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는 닫힌 정치에서 열린 정치로, 동원정치에서 참여정치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깨어 있는 국민이 정치현장을 감시하고 참여할 때 우리의 정치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밝은 내일을 위한 가장 손 쉬운 방법이 선거임을 기억하고, 4 월 11 일 모두가 투표장을 찾는 것을 기대해본다.

② 유나연(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현재 4.11 총선과 관련해 한창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말에 있을 12.19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권 문제와 관련해 뇌물 수수혐의 등은 매 선거마다 문제로 떠오르곤 한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는 '클린 정치'를 내세우고 선거 유세를 펼치는 후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클린 정치'란 말 그대로 Clean 깨끗하고 공정한, 투명한 선거를 지향하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필자는 정치라는 의미를 제고해보고 싶다. 政治. 사전적 의미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야말로 지대한 일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 감투를 쓰고 명예를 이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수많은 노력이 올바르게만 흘러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위의 그래프는 OECD 가입국 중 뇌물공여지수에 따른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방지를 위한 협약(이후, OECD 뇌물방지 협약)'에 대한 이행 수준은 우수하나, 'OECD 뇌물방지 협약'상 제재수단인 법금액수가 다른 비준국들에 비해 재발방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뇌물사건에 대한 처벌기준 및 법인의 책임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2월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22개국 기업의 뇌물공여지수(뇌물공여지수란, 한 국가의 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를 하며 뇌물을 줄 가능성을 국가별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만점인 1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뇌물을 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0=항상 뇌물공여, 10=전혀 뇌물을 안 줌))에서 OECD 14개 국가 중 13위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2011년 현재로는 OECD국가 28개국 중 13위를 차지하며 중위권을 기록했다.



지금도 몇몇 정치인들이 뇌물 수수 비리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제63차 월례 토론회에서도 정치적 사안을 다룬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읽어내는 진정한 승리자가 선출되기를 바라본다.

③ 이정하(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난 3 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강연을 하기 위해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전남대학교를 방문했다. 4.11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안 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모으는 중이라 그런지 그의 전남대 강연 장소에는 학생 말고도 각 언론사 기자들, 총선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필자 역시 안 원장의 강연을 듣기 위해 1 시간 30 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 하지만 이미 그 때도 빽빽하게 줄이 늘어서 있었기에 강의실 입구에도 가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어림짐작할 때 이날 필자처럼 오랫동안 줄만 섰다가 되돌아간 학생이 수백 명은 됐을 것이다.



#4 월 3 일 열린 안철수 원장의 전남대 강연 모습. (이미지출처=CUB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강의실에 겨우 들어간 학생들은 두 시간 넘게 기다린 학생들이었다고 한다. 이들 중 100 명 남짓한 학생은 자리에 앉지도 못했고 계단과 복도, 문 입구에서 선 채로 안 원장의 강연을 경청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예상보다 극심했던 혼잡에 학교 측도 당황했던 모양이다. 당초 교내에서 제일 큰 실내 장소인 3000 석 규모의 대강당을 빌렸는데도 수용하지 못한 인원이 1000 명 정도가 더 나왔기 때문이다.

대학 측은 방송으로나마 안 원장의 강연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부랴부랴 두 번째로 넓은 실내 장소인 용봉홀로 기다리던 학생들 중 일부를 안내했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강연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안 원장의 전남대 강연에만 집중됐던 건 아니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안 원장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안 원장의 말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월 3 일 안철수 원장의 전남대 강연을 보기 위해 줄선 학생들.
(이미지출처=CUB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안 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지난 서울 시장선거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안 원장이 당초 5%지지율에 불과했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를 지원하자마자 선거 판도가 뒤바뀌었다.

안 원장의 지지를 얻은 박 후보의 지지율은 1 위로 상승했고 결국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다음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선 안 원장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를 웃도는 지지율을 나타내며'박근혜 대세론'을 흔들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철수 현상'이다.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안 원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놀랍다. 도대체 안 원장의 어떤 점이 정치에 무관심하던 젊은이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것일까.

안 원장이 젊은이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의사와 함께 청춘 콘서트를 기획하며 전국 강연을 시작한 무렵부터이다. 그의 강연은 기획, 구성부터 기존의 강연과는 차별화됐다.



#안철수 원장의 전남대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지출처=CUB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우선 강연을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매력적이었다.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방향성을 잃고 고민만 가득한 청춘들의 가슴을 찡하게 하면서 그의 말 한 마디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안 원장의 이야기엔 대학생들이 혼자서 끙끙 앓아왔던 개인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정체성 혼란,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취업에 대한 불안, 성공과 꿈에 대한 조언들을 중심으로 공감을 형성하고 이에 답을 제시해 주는 그의 강연은 답답했던 젊은이들의 마음을 뚫어주는 희망의 빛이었다.

20 대가 갈수록 정치에 무관심해지면서 투표율이 낮아진 이유도 젊은이들의 마음 한 곳이 공허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 개인과 사회는 별개라고 생각하며 나만 찾는 일이 먼저였던 그들에게 안 원장의 청춘콘서트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소통의 매개체가 됐다.

안 원장의 강연은 사회의 안전망이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정책이 돼야 하고 우리 개인의 역량은 사회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다. 안 원장 이전에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공감을 나타내며 이해하고 답을 마련해 주는 노력을 했을까?



#4 월 3 일 열린 안철수 원장의 전남대 강연 모습. (이미지출처=CUB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더욱이 안 원장은 불안으로 가득한 젊은이들을 직접 발로 찾아 다니며 자신의 뜻을 전했다. 정치인 대부분이 선거철 즈음에 각 대학 순회강연을 돌며 반짝 표심을 노리는 행보와는 비교됐다.

이러한 안철수의 청춘콘서트는 매번 1000 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입소문이 나면서 결국엔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됐다. 시민들은 경기불황과 사회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을 만났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기득권 정당 소속이거나 누군가의 '라인'에 속했었다는 뻔한 경력을 제외한다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세워야 할 무언가가 없는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많은 시민의 반감. 안 원장은 그런 점에서 신선했다.

많은 지지자들은 안 원장이 한국 사회에선 좋은 직업으로 꼽히는 의사를 포기하고 IT 업계에 발을 들여 백신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스톡옵션을 통해 자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던 따뜻한 인간적 면모에 감동받기도 했다.



#4 월 3 일 열린 안철수 원장의 전남대 강연 모습. (이미지출처=CUB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안철수 현상'은 갑작스럽게 한국사회를 찾아온 변화는 아니다. 정치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만이 참고 참다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결과다. 최근 투표율만 봐도 변화의 조짐을 엿볼 수 있다.

18 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안 원장이 정치권에 등장한 이후 정치에 무관심하던 20 대 젊은 유권자가 정치와 개인을 연결하며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투표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시민정치의 신호탄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에선 '안철수 현상'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발과 야당의 공세가 맞물려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외환위기 이후 어느 정부도 극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잡지 못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소통이 없는 정치가 젊은이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기존 정당들의 행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정치인의 모습보다는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치꾼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안철수 원장의 전남대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지출처=CUB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안철수 현상'은 한 때 반짝하는 유행처럼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바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는 한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기존정당은 변화하는 사회분위기에 맞춰 쇄신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폐쇄적인 정치를 할 수 없을뿐더러 '안철수 현상' 이후에 시민 정치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정당이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계속 추구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와 반하는 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 1 조에는 이런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정치에서의 신뢰와 믿음만이 우리나라 헌법 제 1 조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조재진(한국외국어대학교 루마니아어학과)

네거티브 전략 : 부정적이거나 반감을 살만한 것들을 부각시키는 방법이나 전략
네거티브 광고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선거철이다. 네거티브 전략은 상대방 후보의 약점이나 결점을 얘기하며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네거티브 광고로 꼽히는 것도 선거용 광고였다. '데이지걸'이라 불리는 이 광고는 순진무구한 여자아이가 '원, 투, 쓰리…'하면서 데이지 꽃잎을 떼며 노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꽃잎을 세는 숫자는 이내 미사일 카운트다운과 겹쳐지고, 잠시 후 클로즈업된 소녀의 눈동자에 핵폭탄의 버섯구름이 비치는, 지금 다시 봐도 충격적인 광고다. 즉 '강경파인 상대방 후보를 뽑으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평화를 사랑하는 나에게 투표하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실제로 이 광고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당시 선거에서 경쟁자였던 배리 골드워터를 이기는 데 크게 공헌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네거티브 전략은 일방적인 비방이 주를 이룬다. 우리 나라 정치에서 네거티브 전략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정의 될 수도 있다고 할 만큼 퇴행적이다. 4.11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예비후보들의 공천 경쟁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차별적인 '사생활 파헤치기,' '아니면 말고 식 폭로' '인신공격'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 박빙의 판세를 보이는 곳일수록 네거티브가 횡행하고 상대에 대한 여과없는 유언비어와 인신공격성 비난이 난무한다.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철학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다기 보다는 네거티브 전략이 하나의 당연하고 주된 선거 전략으로 자리 잡은 듯 하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선거와 정치의 선진화의 경종을 울릴 중요한 때다. 네거티브의 난무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신물이 나게 하고, '다 똑 같은 것들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우리 정치의 퇴행을 부추긴다. 참신한 인물 발굴은 실종되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피로감만 가중시킬 것이다.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이력상의 흠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는 물론 필요하다. 그것은 유권자에게 그리고 정치의 선진화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은 결코 검증 절차라는 말로 포장될 수 없다.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2012 년 국민과, 정치인 의식의 선진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⑤ 채련(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오는 4 월 11 일은 19 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철일 때마다 뉴스와 신문, 그리고 거리에서 선거 유세와 공약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쉽게 눈에 보이는 공약들은 '복지'에 관한 정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정책과 안보의 문제보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들은 그것을 일종의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해에 있었던 무상급식만 해도 크게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진흙탕 싸움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당 간의 싸움으로 불거졌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당의 경쟁적 복지정치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그 동안 복지문제는 정치의 쟁점에선 멀게 있었고, 복지정책결정은 대통령, 정부와 관료, 시민단체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복지는 지난 50 년간 정당의 정책경쟁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대북정책에 관한 안보의 문제가 선거의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무상급식문제가 발발했을 때는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은 무상급식이라는 복지정책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 만큼 국민들도 정당도 복지정책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에 관심을 쏟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양극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9 년 지니계수는 0.31 로 다른 국가에 비해 소득불평등지수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빈곤층이 늘어나고 소득상류층이 늘어나면서 중위소득층 기반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된 빈곤층을 지지해 줄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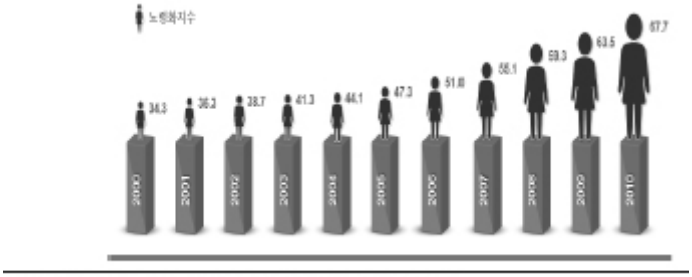
소득계층별 가구분포, 2003-2010

분배지표별	소득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대적빈곤율 (중위소득 50%미만)	시장소득	13.1	13.8	14.7	14.8	15.5	15.0	15.4	14.9
	가처분소득	11.4	12.1	12.9	12.6	12.9	12.9	13.0	12.5
중위소득 (50%~150%미만)	시장소득	67.6	65.5	65.1	63.5	62.7	62.1	62.5	63.6
	가처분소득	70.4	68.7	68.0	67.4	66.7	66.3	66.8	67.5
중위소득 (150%이상)	시장소득	19.4	20.6	20.2	21.7	21.8	22.8	22.1	21.5
	가처분소득	18.2	19.2	19.2	19.9	20.4	20.9	20.1	20.1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검색일 : 2011. 1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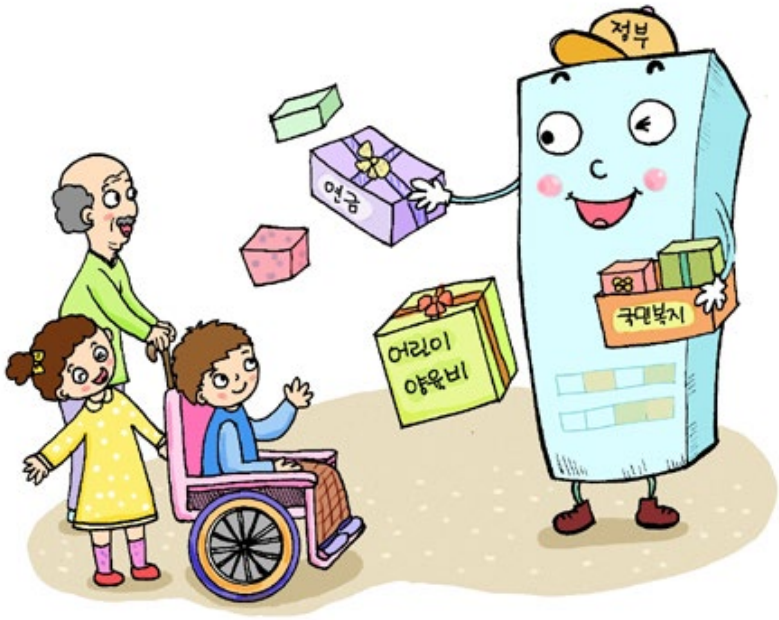
또 하나는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중의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결국 사회의 고령화를 초래하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산과 양육비의 부담, 결국 교육비와 주거비의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 소득층일수록 출산율이 낮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출산과 양육을 부담해야 하는 계층들이 이러한 복지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도 부양할 자녀가 있지 않은 빈곤층인 경우가 많아 노인복지의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45.1% 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전반적으로 출산저하와 노령인구의 증가는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그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검색일 : 2011. 12. 5)

정치권은 서로 더 좋은 복지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복지 포퓰리즘 공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민들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가 그 대안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을 봐서는 국민을 위한 복지라기보다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재원을 늘리기 위해 세율이 증가 될 것이고, 국채가 쌓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본취지인 복지, 안락하고 윤택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의 의미를 흩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에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복지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한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한국선진화포럼의 제 63 차 월례토론회 주제인 "한국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한남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최근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아주 적절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조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정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했습니다.



동영상 시청 中



의견 1)
정당정치의 한계가 오고 있는 듯 하다. 저마다 변화와 혁신을 말하지만 결국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론을 들먹이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이상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없다.

의견 2)
나는 개인적으로 청년비례대표제도 반대이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과연 얼마나 좋은 방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투표선전용으로 청년들을 불러모으기보다는 차라리 국회청년인턴제를 확산시켜서 밑바닥부터 실무적인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견 3)
SNS 의 파워가 대단하긴 하다. 실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국민들 역시 국회의원들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있다. 어찌 되었건 가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이 아닐까

의견 4)
이번 선거 역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전이 되어가고 있다. 후보자들의 망언, 대책없는 공약 더 이상 믿고 싶지도 않다. 어쩌면 역대 투표율이 저조해지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 학생들은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투표! 우리가 투표를 해야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 4 월 11 일 우리 모두 투표 합시다!



② 전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선진화 연구모임이 두 번째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경상대학 세미나실 2 호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월례토론회를 먼저 시청하고 이번달 주제인 한국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큰 주제 안에서도 월례토론회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던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에 안철수 원장이 조만간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진 터라 알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회자 역할을 맡으며 평소대로 찬성팀 반대팀 2:2 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봉성 군과 최송현 양이 찬성팀, 배상아 양과 최재원 양이 반대팀을 맡으면서 약 한 시간 반 가량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찬성팀은 안철수 현상이 가져온 정치의 새 변화는 새로운 한패러다임을 만들어 다음 정치 패러다임이 생길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지난해 서울시장 재선에서 무소속이였던 박원순 후보가 여당의 강력한 후보였던 나경원 후보를 낙선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초기 박 후보의 지지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를 지지하자 마자 나경원 후보를 뛰어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당선된 것이죠! 이 현상만 봐도 안철수 현상의 단편적 모습과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스스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존경받는 박경철 의사, 이외수 소설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와 함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기대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식인 층이 SNS 공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공감하는 팔로워들이 생기는 것은 이제 정치를 일반인과 먼 분야가 아니라 현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과 IT 기술의 발달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정당정치에서 새로운 인물을 발견할 수 없고 새로운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심리입니다. 여야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새로운 후보가 나타나지만 과거의 후보와 다르다는 인식을 제대로 심어줄 수 없게 된 것이죠. 같은 정당에서 나온 사람이며 결국은 자신의 정당과 사익을 위한 정치를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MB 정권에 들어서 사회운동, 반발 등 크고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여론과 다른 행동을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보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치적 행동이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게 한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안철수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안철수 현상은 젊은이들을 통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도 대학생들 어느 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이를 인정하지만 그 외의 다수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기는 힘이 듭니다. 안철수 현상의 근본바람 원인 그의 행적을 알지도 못하고 여론에 휩쓸려 안철수! 안철수! 만을 외치는 무리도 존재하므로 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태세입니다. 또한 아직 한 세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중노년기 층에서는 안철수 현상을 받아드리고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인물정치가 아닌 지역별 정당정치로 선호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한 세대가 끝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인물로 정치를 결정하기에는 다소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적어도 10 년간은 정당정치가 지속될 것입니다.

둘째, 기득권정당이 안철수 현상을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안철수 현상은 분명히 새로운 바람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정당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입하는 안철수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요? 이미 강용석의원도 안철수원장의 스톡옵션을 조작이었다고 말하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일일이 꼬집어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대선에서도 새로운 인물로 참신한 정책을 가지고 온 인물이 있었지만 반짝 빛을 보이는 듯하다가 지고 말았습니다. 정치에서 정당을 통한 것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자신의 역량만으로 살아남기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현상 역시 기간이 오래가기는 하겠지만 영원할 것이라고는 보장하기는 힘듭니다.

이미 그 전날 안철수 현상에 대해 주제를 논할 것이라고 통보를 하여서 그런지 자료를 준비를 해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알찬 토론내용이어서 너무 좋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③ 청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3 월 21 일 청주대학교 선진화 스터디 모임 2 차 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 63 차 월례토론회, 한국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 분석과 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크게 정당정치의 위기, SNS 혁명, 앞으로 우리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세 가지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는데요.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청주대학생이 본 한국정치는 어떠한 모습인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선진화 스터디원들은 어떠한 언론매체, SNS 를 주로 사용하고 보고 있을까요??(중복선택)







조선일보 : 1 명 중앙일보 : 1 명
나는꼼수다 : 3 명 한겨레 : 1 명
경향신문 : 1 명 한국경제 : 4 명
매일경제 : 2 명 기타, 인터넷매체, 뉴스타파,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시사되지등), : 2 명
페이스북 : 5 명 트위터 :1 명

*** 자신이 정치의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있다 : 4 명 관심없다 : 6 명
@관심이 없는 이유는?



- 정치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 이해하기 힘들다.
- 서로 다투기만 한다.
- 우리나라 정치에 우려가 깊다
- 제대로 된 안건 상정이 안 된다.
- 제대로 된 공약이 없고 지켜지지도 않는다.

청주대 선진화 스터디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시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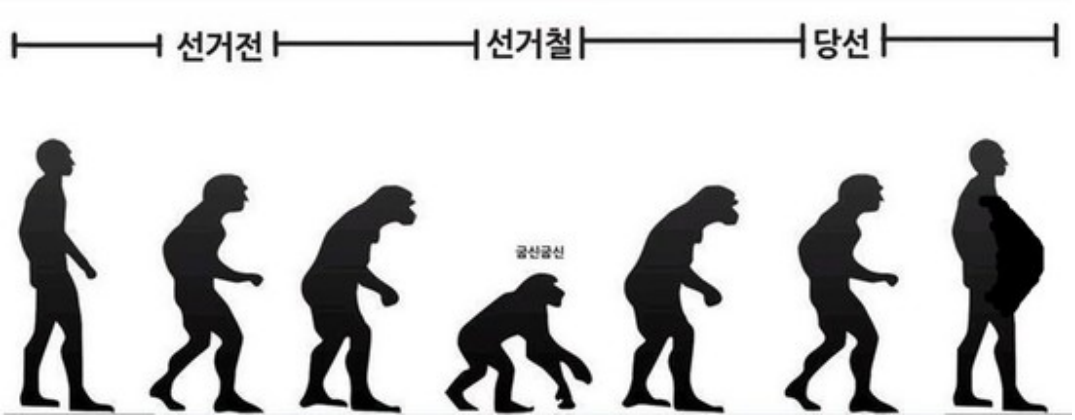




* 정당정치의 위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안성모 학생 : 정치인들의 공약이 너무 포퓰리즘, 즉 투표를 얻기 위한 공약인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인지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결국 불신의 정치가 정당정치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요?

- 전인섭 학생 : 거대정당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만 관심을 가져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정치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일된 의견이 없어지고 오로지 선거 때에도 새로운 인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임세혁 학생 : 세대 가치관이 변화하였습니다. 기존 수구세력,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정부구조가 또는 정치 상하구조의 괴리가 발생하고 폐쇄적인 지역주의로 이어졌으며 많은 비리가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미디어와 정당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생활정치가 모호해졌습니다. 정당정치가 변화하는 우리세대 흐름에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결국 쇠퇴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 안준철 학생 : 변화해야 한다는 말은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지켜지지 않고 서로의 이득을 위해 싸우는 모습만 봐왔습니다. 정당정치 위기는 정당 스스로 불러온 문제입니다.

- 정예연 학생 : 불신이 점점 깊어지는 게 문제일 텐데요, 저는 요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진보라고 불리는 언론과 보수라고 불리는 언론을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시각이 너무 다릅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대해서 부족한 저 같은 젊은 학생의 경우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객관적 일수 있는 건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제주해군기지를 예로 들면 언론매체에 성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극명히 갈리는 것처럼 제대로 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도 우리들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황윤미 학생의 생각은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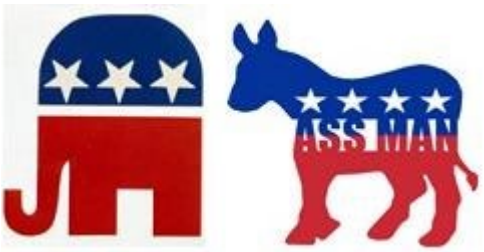
- 황윤미 학생 : 예를 들어 2007 년 대선을 보면 경제만은 살리겠다라는 어떤 후보의 특징적인 공약이나 각오들이 두르러졌었습니다. 요즘도 정말 실질적으로 공약을 이행 할 수 있는 것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표어 적인 공약이 나오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당이 너무 인물 중심으로만 흐르는 것 같고, 반드시 아래로부터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장정임 학생 : 자극적인 이슈 중심으로만 정치가 흐르는 것 같고 너무 선거철에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선을 하고 보자는 생각들인 것 같아 그게 더 문제로 보입니다. 당선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치에 대해 무관심이 생기구요.

- 김상진 학생 : 미국을 보면 선진화된 민주주의가 200 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물중심이고 예전에 선거에서 호남지역 득표율이 무려 90%이상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대로 된 정치가 23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발달되기 위한 하나의 문제 있는 상황이라 표현하고 싶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원혁 학생 : 격한 장면, 특히 올해에는 최루탄을 터뜨리고 하는 모습들에 이에 해당될 텐데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 그러한 모습들로 각인되고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하는 행동들, 연극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대부분들이 변호사, 검사, 기업 CEO 출신 등 잘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우리 같은 서민들 삶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이철우 학생 : 우리나라가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수 엘리트들 중심으로 이끌어지다 보니 정치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는 정보, 통신이 발달하였고 수평적, 즉 쌍방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엘리트들이 우리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잇속만 챙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박원순 신드롬도 밑에서부터 열심히 일해 자수성가한 분들이 사회에 옳은 지적과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관심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청주대 학생들의 한국정치가 개선되어야 할 점은?**

- 시민 참여/ 쌍방소통 / 대립관계가 아닌 양립관계수립/ 존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 젊은이들과 많이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 작년, 올해 키워드 바로 소통과 화합이었듯, SNS 등을 이용해 개인적인 소통이 점점 늘어나 정치관심이 높아져야 합니다.

- 전 세대에 걸쳐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즉 Mind share 가 일어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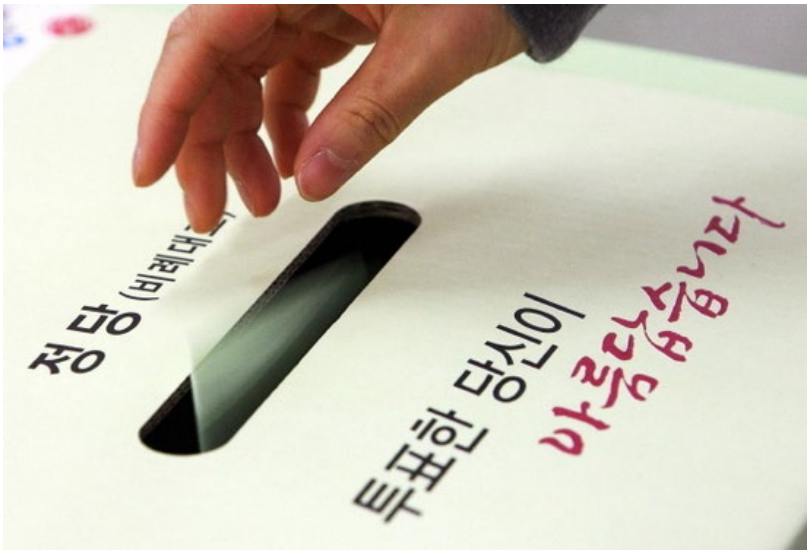
- 변화하는 흐름을 인식하고 고정된 틀을 깨어야 합니다.

- 뉴미디어 발달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답
투표한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선진화 과제 37:

한중일 새로운 지도자 체제에서의 동북아 정세:

박근혜 정부의 대외/대북 전략

(제 72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민희(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적, 대외적으로 불안한 정세 속에 놓여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그 와중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향한 열망을 폭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불안한 동북아 정세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을 향해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으며, 6 개 나라(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북한)의 리더십 교체로 인해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 젊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난 20 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소하고 아직도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핵 개발에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몇 십 년간 북한의 도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바로 오늘도 북한은 UN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체제 선언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과의 정전 협정을 전면 백지화하는 등 완전한 비협조적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도 대북정책에 관한 강한 언급을 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좀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키워드는 '신뢰' 입니다. 신뢰에서 출발한 협력은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북한을 절대적인 약소국으로 바라보았고, 그 논리에 따라 무조건적인 원조와 지원이 남북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고였으며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북한은 결코 약소국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약소국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절대적인 강자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전환에서 출발해 구축되는 신뢰야 말로 미래의 동북아 평화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일 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통일을 위해 본질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통일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변국과의 동맹관계를 넘어서 현실과 미래를 넘나드는 분석을 통해 강국과 약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략적 국가관계를 고려하며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안보 문제든 통일 문제든 우리는 국제적인 분위기와 흐름에 발맞추어 적절한 정책들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북한은 3 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그 성공에 따라 자축하고 있는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3 차 핵실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실질적인 대북정책을 세워야 하며 그에 따른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에 핵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핵이 떨어진 지역의 국민들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 핵으로 인해모든 수원이 오염되어 물 부족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머지않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은 매번 미국을 겨냥해 핵 도발을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핵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부드러운 대응책을 펼쳐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또한 안일한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심각성을 깨닫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뚜렷하고 자신감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러한 당당한 대응책을 펼쳤을 때 다른 국가들도 우리 편에 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북체제가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3 차 핵실험이 성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북한 내부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었지만, 과연 이것을 북한의 성공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의견이 분분하며 전문가들은 이것을 북한의 실패로 판단하고 김정은 체제의 끝을 앞당기는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외교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강력한 제제협상을 해야 합니다. 강력한 대북체제를 통해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고 동시에 '대화'라는 활로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강도의 Plan-B 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어떠한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또한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 설득하고 함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3 차 핵실험에 이어 현재 UN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체제 결정, 그리고 그에 따른 북한의 강력한 대응 등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대 전략'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계속되는 위기와 긴장 속에서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6 개 나라의 리더십 교체와 함께 일어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국가는 서로 긴밀한 협조와 실질적인 대응책을 논함으로써 동북아 정세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태까지의 Mild 했던 대북정책과 낡은 사고방식은 내던져 버리고, 이제는 좀 더 당당하고 Wild 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원조와 대화시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북한이 저질렀던 금강산 관광객 피살, 핵실험 강행, 천안함 폭침 등의 북 도발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의 노선을 함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강경책만을 펼친다면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플랜 B 의 활로 또한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이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쏟는다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써 미래를 위해 좀 더 넓은 의미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어 내야하며, 더 나아가 자연스럽고 행복한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② 김한얼(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한반도에 닥쳐오는 전쟁의 위기

북한이 연일 강도 높은 도발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정전 협정 폐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모자라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대응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라 한반도에 전례 없는 긴장 기류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 제재를 담은 결의안 2094 호를 채택하고 대대적인 압박 공세를 이어나가겠다고 천명하자마자 북한은 연례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가 시작되는 11 일에 남북불가침조약을 무효화하고 전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이 여느 때보다 심각한 이유는 지난 20 년 동안 북핵 문제가 진행되면서 형성되었던 전형적인 패턴이 깨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핵 문제는 '북한의 도발->국제사회의 제재->대화를 통한 합의'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죠. 따라서 유엔 안보리 수준의 대북 제재가 공식적으로 발안이 되면 북한은 어느 정도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협상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 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올해 1 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2 월 북한의 3 차 핵실험->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합의'로 이어지는 이번 상황 어디에서도 대화 국면은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

상황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 밝혔던 대북 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출범 당시 박근혜 정부는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와 평화롭고 안정된 동북아의 신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 기조의 핵심 현안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존 7.4 남북 공동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에 담긴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을 주된 원칙으로 하고 있었죠.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3 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 일, 남북의 모든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신만 난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한반도 핵무장론'이 다시금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3 차 핵실험에서도 드러났듯이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핵경쟁의 시대로의 진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특히 남북 간의 군사력의 비대칭과 불균형은 점차 심화될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고 또한 북한만이 핵을 보유한 현 상황은 북한에게 핵 군축협상의 빌미만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의 핵보유에 맞서 우리의 핵보유 및 핵전략 증강이 기정사실화 되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깨지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변 주변국의 '핵개발 도미노' 현상과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우리의 안보에도 많은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국방비 투자를 더욱 증가해야 하는 부담은 곧바로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게 되면 외국의 투자 감소 등 경제활동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는 리스크 또한 산재해있습니다.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가능한 한반도를 위해

잠재성장률 3% 미만, 얼어붙은 고용 시장과 높은 실업률, 중산층 붕괴에 따른 양극화 현상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가뜩이나 많은데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위협까지 겹쳐 지금 '박근혜 호'는 닻을 올리기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호의 순탄한 여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핵문제라는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서로 간의 불신이 팽배해있는 상태에서는 갈등만 심화될 뿐입니다. 이번 사태가 제 2 의 6.25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불신의 골을 좁히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핵으로 핵을 억제한다는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상생하는 한반도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가동을 위해서 6 자 회담 등 그들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는 등의 복안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기존의 햇볕정책에서 강경기조를 거쳐 신뢰 프로세스로 원만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자체 핵억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대북 및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 수렴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북한의 잘못된 행태나 무모한 위협에 대해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확립하고 위기국면을 통일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부단히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두산 광고 카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은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가능한 행동을 보였을 때 쌓여갑니다. 평화라는 대원칙 아래 약속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믿음의 한반도를 기대해봅니다.

③ 백유민(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최근 우리나라와 그 주변 국가들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이 변동하고 있다. 2012 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지도자 선출이 있었으며 그 전 해에는 북한의 오랜 지도자였던 김정일의 죽음과 함께 젊은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각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국가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의 위기를 조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북한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외교' 전략을 바탕으로 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군사적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핵이라는 파괴적인 무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따르게 한다.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해 이끌어낸 협의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예기치 못한 갈등 상황이 존재하였다. 1994 년 처음으로 북핵에 대하여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루어진 제네바 핵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2005 년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19 공동성명의 불이행에서부터 연평해전,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기 보다는 서로에 대한 불신만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던 차에 다자간 대화 창구였던 6 자 회담은 2007 년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후에도 남북한은 어떠한 대화 없이 갈등 상황만 고조되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한 북한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현 상황이 극에 달하여 남북 관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은 확실해 보인다. 현재 북한이 정전협정을 폐기할 의도까지 표명한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대북고강도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표결에 임하였던 만큼 현재의 한반도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벼랑 끝까지 몰린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만큼 앞으로도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북한의 군사 공격에 대응할 강력한 군사 공세 대비책이 정비되어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방국들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대북제재를 정교하게 이끌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들의 인식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내부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대북 정책을 시행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동구권이 붕괴할 당시 북한도 곧 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그 이후 20 년 간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어서 빨리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는 우리만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재에도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많이 약화된 점도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정전으로 인해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의 도발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명확히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현재의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대비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군사적 도발에 대응할만한 우리의 군사력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남북관계를 우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도 우리에게는 주어져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과거 행적을 살펴볼 때에는 남북한 간의 신뢰를 이끌어냈던 경험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화의 창구가 다시 열려야 한다. 다자간 회담은 양 국 간의 갈등 상황을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남북한의 문제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 대화를 통해 이끌어 낸 방안에 대해서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지켜나가며 남한과 북한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부터 시행해 나가면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전아영: 안녕하세요, 북한학과 학우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제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한국선진화포럼의 제72차 월례토론회 주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외/대북 전략' 에 대해서 입니다. 먼저 저희 모두가 북한학도인 만큼 심도 있고 톡톡 튀는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현재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특히 이명박 전 정부를 시작으로 잦은 도발로 인해 충돌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이 시점이 남북관계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 일 키 리졸브 훈련을 기점으로 북한은 한반도 정전협정백지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즉, 11 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공식적인 전쟁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불감증 또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반도가 곧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반해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은 너무나도 평온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세기 전, 남한과 북한이 맺었던 6. 25 전쟁의 끝은 "종전(終戰)" 이 아닌 "정전(停戰)" 이었습니다. 진정한 끝이 아니었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영원히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이환 학우, 한반도의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정말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윗줄 왼쪽, 이상욱(북한 3) / 김동욱(북한 3) / 김이환(북한 2) / 백상민(북한 2) / 유주혁(북한 3)
아랫줄 왼쪽, 추유나(북한 3) / 한선주(북한 3) / 김다은(북한 2) / 조수정(북한 4) / 사회자:
전아영(북한 3)]

김이환: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곤 있지만 한미 간의 막강한 군사력이 집중되어 훈련 중인 키 리졸브 훈련기간에는 사실상 적의 도발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훈련 중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은 곧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북한정권의 최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 도발을 하겠다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하지만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어느 정도 카운터파트너로서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현재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직접적인 도발은 힘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북한 내부의 정권의 불안정에서 오는 최근의 도발의 원인으로 봤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방심했을 때 북한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으로는 크게 3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1 차적인 적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적의 도발의지 자체를 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김관진 이펙트에서 나온 것으로 국방장관이나 대통령 혹은 군의 지휘관들이 적이 도발하는 그 자리를 적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도발의지 자체를 꺾어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도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 체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방개혁을 완성시키고 수비형 부대배치에서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공세형 부대의 재배치를 중심으로 참모형 군대에서 야전형 군대로의 체질 개선이 지속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셋째, 이러한 파국의 남북관계에서도 대통령은 적의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처하지만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힘이 있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관에서는 끊임없이 북한정권과 군 인민을 이간할 수 있는 공작을 펴야 하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통일부를 중심으로 하여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전아영: 김이환 학우의 깊이 있는 발언 감사드립니다. 2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저도 김이환 학우의 발언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직접적 도발의 실질적인 가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과 더불어 지난 2008 년에 있었던 금강산 관광객피살 사건과 같이 북한과 사이가 원만할 때도 북한은 이렇게 우리들의 뒤통수를 때리곤 했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확한 진상 규명과 사과는 흐지부지 넘어가곤 했었지요. 이제 우리는 김이환 학우가 말하신 김관진 이펙트의 자세로 북한의 도발에 누구보다도 강경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는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곤 하지만, 북한은 상식적으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은 엄격하고 엄하게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은 조수정 학우의 발언 듣겠습니다.

조수정: 저도 김이환 학우의 발언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저는 5.24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변화하면서 슬슬 주변에서는 강경한 대북정책인 5.24 조치의 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 발언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과연 5.24 조치의 해체가 옳은 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명심해야 할 것은 5.24 조치가 단순히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천안함 폭침 사건(2010 년 3 월 26 일)을 시작으로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제시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5. 24 조치는 단순히 남북관계, 북한에 대한식량지원 등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만 하는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5. 24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 실시되었던 정책이었습니다. 더불어 5. 24 조치 기조 하에서도, 2012 년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의 생산성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익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5. 24 조치를 이유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말들은 틀리다고 봅니다.

물론 5. 24 조치가 남북관계의 긴장에 가속도를 붙인 시발점이라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때의 상황(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북한의 도발)에는 알맞게 시행된 대북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의 흐름을 통틀어 봤을 때, 5. 24 조치의 시행은 적절했고 꼭 필요했던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5. 24 조치가 해제되기엔 이르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을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는 충분한 핵 억지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 입니다. 게다가 사회 내부에는 아직 종북 세력과 같은 불순분자들이 활개를 치며 우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대외적인 정책마저 유화정책의 방향으로 돌려버린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아영: 네, 조수정 학우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물가물했던 5.24 조치에 대해 다시 한 번 배워본 것 같은데요.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악화만을 우려해 북한에게 가했던 모든 강경정책들을 없애자는 목소리들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김동욱 학우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우선 남북관계는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정착되는 날까지는 당분간 이 모습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는 현 김관진 장관처럼 도발원점까지 타격시키는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전 정부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할 것이고, 그럼 그 도발 때문에 통진당같은 사람들의 주도 하에 남남갈등 유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더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측 전력이 북한보다 강한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상대는 미국입니다. 이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북한은 생각보다 쉽게 우리를 공격하진 못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전아영: 하지만 제 생각에 이명박 전 정부의 대북정책은 소극적이었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조수정학우의 발언과 같이, 이명박 전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5.24 조치를 통해 가장 강경한 대북정책을 피지 않았었나요?

김동욱: 역대 정부를 치고는 제일 강경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강경정책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을 참여시키는 걸 말합니다. 북한의 생명줄과 직결되어 있는 경제제재에 중국을 참여시키자는 것입니다.

전아영: 네, 김동욱 학우의 의견도 맞습니다. 북한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이제는 미국과 함께 대등하게 세계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094 호에 중국과 러시아 모두가 만장일치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국이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했으면 바랄 것이 없지만, 그래도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지금 중국의 행보는 북한을 더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다은 학우의 발언 듣겠습니다.



[윗줄 왼쪽, 이상욱(북한 3) / 김동욱(북한 3) / 김이환(북한 2) / 백상민(북한 2) / 유주혁(북한 3)
아랫줄 왼쪽, 전아영(북한 3) / 추유나(북한 3) / 한선주(북한 3) / 김다은(북한 2) / 조수정(북한 4)]

김다은: 저 역시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처럼 반항하는 것에는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에 발언하셨던 분들보다는 좀 더 유화적인 입장이에요. 북한에게 채찍질만 가해서는 안 돼요. 마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춘기 시절의 동생을 다루듯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남한과 북한은 한 핏줄이고 가족입니다.

가족이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아이를 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우리 남한이 북한의 형이라는 마음으로 북한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둘 다 적절히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당근을 줄 때는 어디에 다른 속셈이 있는지 잘 알아보고 살펴야 하며 우리가 주는 당근을 올바르고 잘 먹는지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아영: 맞습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사춘기의 북한과 우리는 북한의 형이 되야 한다는 말이 참 와 닿는 것 같습니다. 하긴 만약 채찍질을 써서 말을 들을 북한이라면 현재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럼 다음은 추유나 학우의 발언입니다.

추유나: 과거 북한의 행동 패턴으로 유추해보면, 북한은 당분간 위협과 협박을 일삼으며 체제 내부 긴장을 한껏 고조시키는 한편, 새로운 남한 정권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인해 우리의 내부가 분열 되었을 때, 북한은 우리에게 슬쩍 대화의 손을 내밀어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한 발 양보해 준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북한이 살짝 내민 손을 잡아볼 것인가, 아니면 뿌려 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패턴은 공산주의자들의 생존과 협상전략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내미는 화해의 손길이 진심이 아닌 검은 속내일 수도 있으니까요. 북한의 위협에 대한대비 및 대응은 착실히 준비하고 공고히 하되, 그들이 대화를 제스처를 보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을 정립해둘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욱: 지금까지의 북한은 도발을 한 뒤 대화를 제의하는 냉온전술을 구사해 왔습니다. 최근 이어진 일련의 도발들은 유례없이 공격적이긴 했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도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과시하고 한미의 대응을 시험해봤다는 가설은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남한은 무대응에 가까운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이때, 북한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어 남북관계의 주도관을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전쟁 위협을 불사하는 도발에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약세를 보이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에 굴복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또한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이 더 이상 섣부른 도발을 감행할 수 없게 압박하고 먼저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키 리졸브 훈련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합니다. 그러나 전면전, 벌초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사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며 위협하는 상대에게 전쟁이 두렵단 이유로 방어훈련마저 포기한다면 적의 위협에 스스로 굴복하는 꼴이 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국가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두려워 자위를 위한 방어훈련마저 기피하는 국가는 결코 국민과 국토를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아영: 추유나 학우와 이상욱 학우의 발언대로 북한은 남한을 대상으로 냉온탕 전략을 써왔습니다. 한껏 차갑다가도, 때가 지나면 누구보다도 부드러워지는... 이런 북한의 농간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혹시 북한 내부에서 와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백상민: 작년 말에 김정은을 위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다행히 조기에 발각되어 위해를 시도한 사람은 실각되고 사건이 조용히 수습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높여있으며, 주위에 아직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키 리졸브 라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남한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군부 결집을 도모하고 젊은 지도자로서 자신을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연령대가 높은 고위층을 향한 일종의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 초기의 결단력을 보여줌으로써 대내외 긴장을 조성하 향후 대내외 외교 및 행정에 있어서 우위를 독점하려는 모습으로도 분석됩니다. 따라서 군사적 긴장을 통한 대외압박은 단순히 김정은 정권의 강화와 결집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북한의 급변사태의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아영: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 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마당에, 북한의 계속되는 반발과 도발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선주: 저는 최근 국제정세가 모두 변한 이 시점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3 년은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 판도가 바뀌는 시국이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도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적 행태가 맘에 안 드는 것을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진짜로 전쟁을 일으킬지 말지는 항상 북한만이 알아왔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북한의 도발 목적은 비슷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의 최대 목표는 경제 살리기이며 개방은 곧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폐쇄적인 북한조차도 간접적인 경제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김정은의 이러한 군사적 도발 역시 경제적인 정치의 일환으로 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정권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닐까?하는 생각 말입니다. 정말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남한과 북한 모두가 입을 손해는 생각하기도 끔찍할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북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힘든데 전쟁을 일으켜서 이긴다 한들, 다시 일으켜 세울 엄두조차 낼 수 있을까를 김정은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북한의 어쭙잖은 겁주기에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겁주기라는 것을 안 이상, 그것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을 더 자극해서 정말로 미사일이라도 쏘게끔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강경노선을 걸어야 하고, 북한을 필요이상으로 도발하지 않는 선에선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여 움직이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현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말하고 내세웠던 북한에 대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굳건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주혁: 3 차 북 핵실험 강행, 로켓발사 등은 물론 유례없는 강력한 구두발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정세는 위험합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은 중국의 대북정책기조변화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동의, 실리외교 노선 추구, 전통주의(전략주의)등의 이유로 더욱더 고립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대규모 도발이나 북핵공격 등은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미연합사체제하에서 실시하는 키 리졸브나 유사시에 미군의 자동개입 시나리오 등은 아직까지 대북억제력이 실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실시한 B-52(폭탄을 최대 27t 까지 탑재하고 6400 ㎞ 이상을 날아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는 폭격기로 공대지 핵미사일을 탑재)의 한반도 훈련 투입은 강한 대북억제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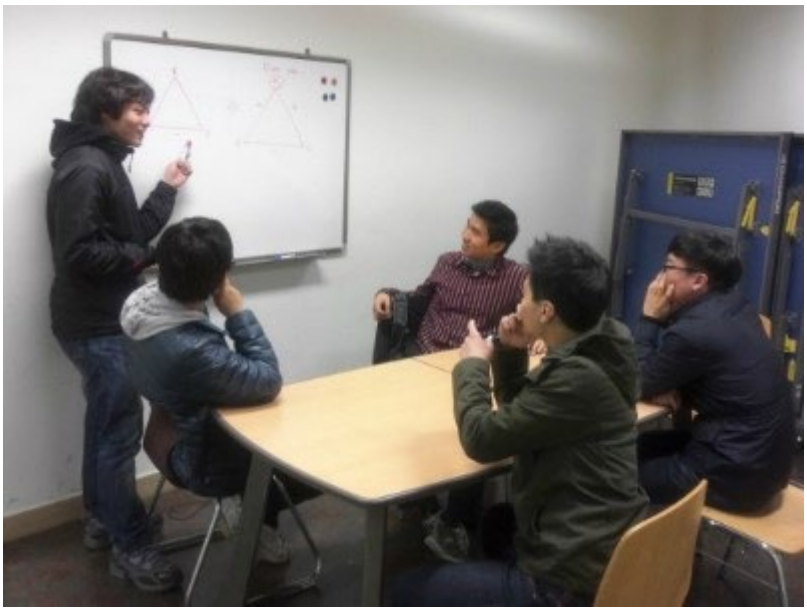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껏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도발을 감행해 왔기에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이 한미연합사체제 하에 전술핵 재배치나 MD 체제가입 등으로 더욱 확실한 대북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전작권회수에 따른 연합사 해체 이후 구상 중인 연합참모협조단의 성격을 기존의 지휘기구로 유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아영: 동국대 김용현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북한은 저강도의 도발, 즉 동해안에 미사일 발사 등의 낮은 강도의 도발은 시도할지 몰라도 막상 그 이후에 영토를 직접 타격하는 무모한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 동일한 대응으로 맞서기 보다는 김정은 정권의 행보를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향후 행보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일한 전략에 대해 동일하게 맞선다면 결국 양측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치킨게임과 같은 양상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북한은 무리한 군사훈련을 통해 병사들을 혹사시키고 있으며 실제로도 군부대를 탈영하는 병사들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준이 아니라 지나친 국력 소모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군부 내부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맞대응은 불필요하며 향후 행보를 지켜보고 연구하면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좀 더 지그시 바라보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 1 차 고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②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박천영(연세정외4):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모신 이유는 한국선진화포럼의 제 72차 월례토론회 주제인 동북아 정세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외/대북 전략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동북아 주요 3국이 리더십 교체를 하면서 새롭게 전개될 국제정세와 함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이 UN안보리에서 공식적인 주제로 발의가 되면서 대북제재결의안까지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에 맞춰 이제 첫 출항을 시작한 박근혜 정부의 대외/대북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에 대한 토론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보신 월례토론회 발제문 및 토론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참여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새로운 청사진으로 “동북아 헬싱키 프로세스” 즉, 신뢰를 통한 협력의 프로세스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또한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벼운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동혜(연세정외 4): 지금 현재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정권을 이어받은 김정은의 리더십이 북한에서 평가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대외적으로도 북한이 식량 및 경제 지원을 위해 어필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쉽게 진정될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제 2 의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물리적 도발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더구나 지금 현재 교류의 루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성공단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쪽 상황을 알 수 없는 만큼 사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최형창(연세사회 3): 네 저도 최악이라고 봅니다. 항상 남북관계를 비교할 때, 10 년 전 정권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김영삼 정권을 제외한 모든 정권이 7·4 남북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과 같이 교류의 끈은

놓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되면서 남북간의 교류가 아예 전무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겠죠. 물론, 이명박 정권이 무조건 비난 받아야 할 것은 아니죠, 당시 상황이나 그에 맞는 이유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정권 말에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보는 것이 다음 정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임지환(연세정외 3): 제가 보기에는 보수정권이 두 번의 정부를 이어가면서 그런 것이라고 봐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상호주의였잖아요. 하지만, 북한도 역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정권교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살만했지만,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내부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고, 대외적으로는 남한과 미국은 강경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에요. 그런데 또 지금 현재 키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한마디로 북한 앞마당에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북한은 그래서 군사적 도발도 불사할 만큼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식(서강경영 3): 그 동안에도 북한 위협은 항상 있어왔지만, 이만큼 크게 와 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앞서 형창 씨가 말씀 하셨듯이 과거에는 명목적인 교류가 있어와서 북한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탁구 치듯이 서로의 합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상호주의 원칙으로 프로세스가 바뀌어 버리니까 북한에서 혼란스럽고, 그 혼란스러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저희 쪽에서도 예상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더욱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일 수도 있죠.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니까 앞의 이명박 정부와 같은 색깔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천영(연세정외 4): 여러분들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일단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이다, 대화의 채널은 다 닫혀있고, 그나마 남은 교류의 끈은 개성공단 하나뿐이다. 그런데, 북한의 내부적 상황도 힘들고, 대외적 환경도 북한에 불리하기에 북한의 태도는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이명박 정권의 상호주의 원칙으로 과거의 햇볕정책과 다른 태도이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또 메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매우 원론적인 질문을 먼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통일은 과연 해야 하는 것일까요?

최형창(연세사회 3): 저 또한 그 질문을 다른 토론자 분들께 묻고 싶었어요. 일단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방향이 다를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항상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심지어 야권에 계신 분들도 통일에 대해 좀 회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이 통일이 될만한 상황도 아니기에, 그저 막연히 미래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 명의 애국자의 입장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통일은 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이산가족 문제도 많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10 년, 20 년의 시기를 놓치면 영영 다른 나라로 살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동혜(연세정외 4):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통일이 돼야겠다고 생각해요. 또한,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포화상태이기에 경제적 역량을 더 크게 하고자 한다면, 통일이 되면 좋겠죠. 독일이 지금 G7 중에서 유럽의 맹주라고 불릴 만큼 발전한 것도 독일 통일 이후 관리를 잘해서 근 10 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지환(연세정외 4):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요. 민족주의적으로 생각하면 통일을 하는 것은 맞는다고 봐요. 독일 케이스를 들었는데, 독일의 케이스가 우리나라의 케이스과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차이보다 지금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는 10 배 이상 넘어가잖아요? 이건 서로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북한을 그냥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국내적인 상황도 나빠서 북한을 끌어안고 갈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북한의 과거 행적으로 보면 그렇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통일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강민식(서강경영 3):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북한의 인민들을 생각하면 연민의 감정이 들어요. 제가 싫은 건 북한의 통수권이라는 거죠.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북한의 통수권의 이미지로 인해 북한 전체의 이미지 자체가 나빠지고 있어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봐서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북한의 경제력과 비교해서 남한은 40 배 더 큰 경제력을 지니고 있어요. 북한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통일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에요. 하지만, 그 큰 경제력 차이로 인해 느끼는 개인적 부담 때문에 반대가 상당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부담만 없다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대륙에 붙어있다고 하지만, 남한은 지금 섬이나 다름이 없어요. 무역적인 면으로도 비용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막상 보면 지금 교류의 채널이 다 끊긴 이 상태에서 남한이 해줄 수 있는 건 딱히 없어요. 도저히 어디서부터 도와야 할 것도 막막한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북한 쪽에서 대화가 가능하다면, 경제적 수준을 올릴 수는 방법을 강구할 텐데요. 개성공단과 같은 것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게 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기가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통일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임지환(연세정외 3): 그러니까 통일이 힘들다는 거에요. 지금 당장 통일이 되면 수많은 북한 인민들이 남한으로 밀려들어올 텐데, 그게 감당이 될 것이냐가 문제에요. 지금 상황이면 누가 북한에 있고 싶겠어요.

김동혜(연세정외 4): 그러니까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도 점진적인 통일을 바라는 거에요.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점진적인 통일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북한정권을 어떻게 할 거냐가 또 문제가 되죠.

강민식(서강경영 3): 점진적인 통일 과정을 이행한다고 해도, 북한이 그 점진적인 과정의 시작조차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에서 양보를 해주는 만큼 그에 합당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의 지원도 국내에도 못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북한에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대화에 임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의 체제는 공고히 하면서 양보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짓은 '양아치' 같은 짓에 불과해요.

최형창(연세사회 3): 네, 맞아요. 그 점은 공감해요. 대부분의 지원이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름 없다는 것이 안타깝죠.

강민식(서강경영 3): 북한이 우리나라의 군대문화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들이 약자였을 때는 혁명을 꿈꿔요. 하지만, 자신들이 강자가 됐을 때는 그런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은 반동분자에요. 마치 이등병 때는 병영문화를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병장 때 밑에 후임들을 보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에요. 자신이 편해지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제 변화, 태도 변화를 하지 않는 거입니다.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약자이기에 북한 체제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북한 통수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에요. 의견 표출을 하는 것 자체가 반역으로 치부되는 사회에서 위에서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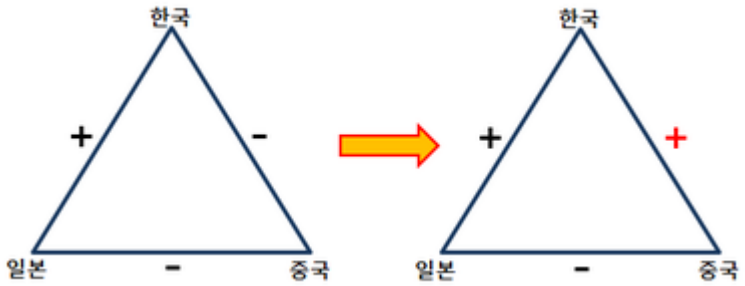
박천영(연세정외 4): 그럼 정리하자면, 북한 통수권의 수구적인 생각 때문에 북한의 내부에서의 자정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통일을 한다면 점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을 함에 있어, 북한의 태도 변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최형창(연세사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는 계속 이어져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흡수통일을 논하는 건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말로 들을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을 그렇다고 아예 포기를 할 수도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흡수통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한다면, 북한의 급변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와의 통일이 아닌 중국에 의한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더 무서워요.

김동혜(연세정외 4):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8 군이 접경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더 무서운 거에요. 그러면, 정말 더 큰 군사적 충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남한이 너무 상호주의적인 태도를 좀 내려놓고 손을 내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북한은 또 미국의 손을 바라는 것 같다는 게 또 다른 문제겠죠.

박천영(연세정외 4): 네, 그럼 이쯤에서 통일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봐요. 이제 메인 질문으로 넘어가서 남북한의 주변국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앞서 말한 "동북아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신뢰(trust)'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신뢰의 프로세스를 통해 동북아 주변국들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 '신뢰'의 프로세스가 동북아에서 가능할까요?

임지환(연세정외 3):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치학자 중에 디트머(Dittmer)라는 사람이 있는데, 트라이앵글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과거 한중일 셋의 관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친해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부정적이에요. 냉전체제의 연장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이 세 국가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났어요. 우선, 한국과 일본은 과거와 같이 긍정적일 거에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이 되고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에 대한 법안이 취소되었다는 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뀔 거에요.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고 특사를 제일 먼저 보낸 곳도 한국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특사를 보낸 곳도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동북아 정세가 한국을 위주로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돼요.



<디트머의 트라이앵글 이론을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주요 3 국 간의 신뢰프로세스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김동혜(연세정외 4): 그렇다면, 한국이 앞으로의 동북아 정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겠군요. 다시 말해, 한국 중심의 신뢰 프로세스는 가능하다는 거겠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최형창(연세사회 3): 하지만, 중국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까가 정말 궁금하네요. 중국이 대외적으로 대북제재를 참여를 해도 북한을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시진핑이 더욱더 대북제재에 대한 의지를 더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임지환(연세정외 3): 중국도 자본주의로 더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한을 상당히 껄끄러운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북한이 중국의 컨트롤에서 벗어나서 국제적 '양아치' 짓을 한다면, 중국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강민식(서강경영 3): 지정학적인 면은 둘째치고 경제적인 면으로는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국가간의 절대적인 신뢰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상대적인 신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더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김동혜(연세정외 4): 솔직히 요즘 국가 관계는 군사 동맹보다는 경제적 협력관계로 더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제 1 수출국으로 생각하고, 중국 또한 한국을 경제적 파트너로써 오히려 북한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상대로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계를 통한 신뢰 프로세스의 시작은 가능하다고 봐요.

최형창(연세사회 3): 하지만, 저희가 동북아 정세를 논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저 트라이앵글에 끼어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 여부는 미중관계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김동혜(연세정외 4):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FTA 가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반미 감정이 최고조로 치달았을 때,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를 경제적인 FTA 를 통해 다시 견고히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신뢰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과의 FTA 를 통해 경제적 협력관계를 견고히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강민식(서강경영 3):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전략적인 FTA 를 통해서 서로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야겠죠. 특히 FTA 는 파기하기 정말 힘드니까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 같아요.

최형창(연세사회 3): 그래서 특별히 미중관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겠네요.

박천영(연세정외 4): 네, 동북아 헬싱키 프로세스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토론이었는데요,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대북 정책으로써 이 헬싱키 프로세스가 유효할까에 대해 논해보면서 이 토론을 마무리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동혜(연세정외 4): 결국은 6 자 회담이 다시 성사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성사가 되려면, 미국에서도 좀 강경한 태도를 내려놓고 북한을 좀 달래서 6 자 회담에 나올 수 있게 해야겠죠.

최형창(연세사회 3): 미국과 중국이 같은 입장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서 6 자 회담으로 데려와야겠죠.

강민식(서강경영 3): 그런데, 그럼 과거의 프로세스를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을 6 자 회담을 데려와도 북한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도발을 하고 난리를 칠 것 같다 이거에요.

최형창(연세사회 3): 그러니까 오히려 교류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교류를 통해 북한의 상황을 좀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야 합니다.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이 대화를 하기에 더 좋을 거 같아요.

강민식(서강경영 3): 그래도 북한에게 과거의 프로세스는 유효하지 않다고 알려줘야 해요. 이런 깡패 같은 행동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죠. 새로운 신뢰 프로세스로 도약할 것이라고 알려줘야겠죠? 그래야 새로운 국면의 동북아 정세, 남북 정세를 기대볼 것 같아요.

임지환(연세정외 3):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동북아 헬싱키 프로세스의 성립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네요. 북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을 알려줘야겠죠.



박천영(연세정외 4):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역시 강대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한국은 북한과의 교류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6 자 회담을 유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조차도 매우 힘든 것 같네요. 그러므로 동북아 헬싱키 프로세스의 가장 키 포인트는 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북한에서도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박근혜 정부의 대외/대북 정책의 귀추가 더 주목되는데요, 부디 동북아 헬싱키 프로세스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토론이었습니다.

③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김유나(정외 12) : 오늘 명지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 첫 번째 연구모임 시간의 주제는 '한중일 새로운 지도자 체제에서의 동북아 정세 : 박근혜 정부의 대외/대북 전략'입니다. 각자 선진화포럼의 월례토론회 동영상을 시청해주셨으니까 요약문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전략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남북간의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등과 같이 교류를 늘리는 방안과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도발에 강경한 대응을 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의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발제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영준(정외 12) : 이명박 전정부에서 선비핵화하고 개방을 통해 교류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객관적 지표를 보면 교류가 다 끊겨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도 선비핵화 전제를 제시하고 교류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와 같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전제가 선비핵화가 된다면 절대 신뢰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영화(정외 12) : 동의합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아래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은 채 지원을 한다면 신뢰가 쌓일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민연(정외 06) :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인도적인데 그 과정에서 신뢰를 얻는다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지원과정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북한이 내정간섭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뢰가 더욱 쌓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기보다 국제기구가 관여한다면 오히려 신뢰 프로세스가 형성되기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대윤(디미 12) :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기에 더 힘들지 않을까요?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해오는 것부터 우리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국의 능동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교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영화(정외 12) : 국제사회의 시각에선 아직 우리나라가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계속해서 도발해온다면 한반도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더욱 강하게 나서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민연(정외 06) :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있다고 봅니다. 포 같은 경우에도 불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좀 더 북한의 도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대윤(디미 12) : 사람들도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만 계속해서 위기의식을 가진다고 해도 국민의 의식이 그렇지 않다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것도 옳지 않지만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윤영준(정외 12) : 근데 강경이 꼭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쪽의 태도이기 때문에 강경이라 했을 때는 무력적 대응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화에서는 강경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적 강경책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지만 저번 수해지원 때 필요한 항목을 북한에서 두 세 개 제시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물품 외에 다른 품목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이명박 전 정부 때보다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지예(정외 12) : 저는 구호물품의 품목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자금으로 돌릴 수 없는 품목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사절단을 거부하는 데에는 분명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평화적 입장에서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평화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규영(정외 13) : 아까 구호물품 얘기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품목을 바꾼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북한에게 다른 자금적 도움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을 뺐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준(정외 12) : 하지만 그 품목이 꼭 위험성 있는 품목이 아니고 수해지원에 필요한 품목이었는데 우리정부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정부와의 관계를 끊어도 북한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전정부가 강경하게 나와서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북한 내에 중국의 기업이 진출한 경우도 있고 강경하게 계속 나가도 우리와의 관계가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박지예(정외 12) : 중국이라는 물꼬가 터져있기는 하지만 중국 외에는 북한의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가면서 중국과의 계속된 대화를 통해 중국 측에서 북한과의 물꼬를 막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윤영준(정외 12) : 하지만 언제 정확히 끊길지 모르는 상황에 계속해서 기다린다면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커질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망한다면 북한 주민의 태도는 지금 중국 쪽으로 흡수되길 바란다는 비율이 더 많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늘리면 안됩니다.



박대윤(디미 12) : 하지만 그 부분은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대비책일 뿐 확실하게 대중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규영(정외 13) : 또한 아까 박대윤 학우가 말씀하셨듯이 점점 보안태세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정작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지 국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전혀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좀 더 국민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게 강경한 대응을 우리나라의 언론을 통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 스스로 위험성을 자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민연(정외 06) : 연평도 때도 위험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지만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북한에게 대응사격으로 날린 우리 포가 제대로 발사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좀 더 철저한 우리정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지예(정외 12) : '의제설정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 데 언론에서 정하는 의제가 국민들에게 의제로 인식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미디어들은 너무 강경한 의제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화적인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경이 중요한 시점인 것은 맞지만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대윤(디미 12) : 2015 년에 미군작전지휘권이 끝나고 우리에게로 넘어올 텐데 박근혜 정부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2015 년 이후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미군의 참전여부를 묶어둘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유나(정외 12) : 네 지금까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학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자면 신뢰 프로세스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같은 교류가 필요한 측면인 것은 맞지만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대응은 물론 무력적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정부 측의 준비가 아직 안돼있음은 물론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스스로가 전쟁이나 북한의 도발에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였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류를 전 정부보다 조금씩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과 중국이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으므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차단되어 고립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가지 의견 모두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같이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강한 맞대응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1 차 명지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 전문이었습니다.

④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송경림(행정 2) : 안녕하세요. 제 1 차 서울여대 선진화 연구모임 사회자를 맡게 된 송경림입니다. 저희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는 제 72 차 월례토론회에서 한중일 새로운 지도자 체제에서의 동북아 정세 : 박근혜 정부의 대외/대북 전략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토론할 주제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북한과의 신뢰가 과연 가능할지, 이러한 신뢰프로세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입니다.

한중일 리더십 교체와 북한이 3 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안보정세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안보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월례토론회에서 유호열 교수님께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1 차적으로 북핵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정부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자 북한의 정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 포기를 선언하였지만 북한을 제외한 6 자 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하며 북한의 도발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낮은 강도의 도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경각심을 유지하며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자인 저 역시 이러한 주장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에게 BDA 제재를 통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 역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에 대한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 내의 달러를 현찰로 소유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달러가 현찰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현찰로 하는 거래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 장혜정 학우부터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민[서양화 2], 박민지[공예 2], 이수아[행정 2], 설미선[행정 2], 장혜정[의류 2], 윤유진[행정 2], 이현경[경영 2])

장혜정(의류 2) : 북한처럼 세계적으로 단절된 나라의 경우, 그 나라의 정치방향이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확실한 것은 신년사라고 생각합니다. 현 북한의 원수인 김정은의 신년사를 살펴본다면, 성군정치에 대한 언급이 주로 인민생활과 경제를 강조하는 것을 본다면 성군정치보다는 성경정치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년사에서 국력이 곧 국력이며,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에 강성국가가 있고 인민의 행복이 있다라는 말에서 성경정치보다는 성군정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년사만을 가지고 북한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의 현 상황과 행정 모습이 핵무기를 강화하고 핵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본다면 김정은의 이번 정치 전략이 성군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폴케네디 예일대 교수가 국가 자원이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에 있으며 국가가 쇠퇴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국가가 강력하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문제를 강력하게 제제해야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신뢰프로세스를 시작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경림(행정 2) : 장혜정 학우 역시 저와 비슷하게 북한의 핵을 통한 도발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유진 학우께서 발언해주세요

윤유진(행정 2) : 이전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이어 이번에 북한이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처럼 북한의 도발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법에 따라서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해서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며 합의하의 협정이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정전협정 폐기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안보가 과연 튼튼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저 역시 사회자 송경림 학우의 의견과 비슷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시작은 북핵문제 해결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안보가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의 국방비는 작년에 비해 4.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4 조원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의 국방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중시키기보다는 저희 안보를 위한 예산을 더 편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경림(행정 2) : 윤유진 학우께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저희의 안보에 관한 예산을 더 늘려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지민 학우께서 발언해주세요.

강지민(서양 2) : 일단, 저 역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송경림 학우, 장혜정 학우, 윤유진 학우가 주장한 것처럼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고 안보를 최우선순위로 선정하여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는 관심, 안보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북한의 도발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으로서 북한의 도발의 1 순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지(공예 2) : 저도 강지민 학우분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국민들의 국가안보의식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을 날리는 기술은 아직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 돼야 가능하고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구축해야 하고 국민들 역시 북한과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경림(행정 2) : 강지민 학우와 박민지 학우께서는 전쟁의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이 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상태에 놓여있고 이에 따라 북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국민들 역시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제 이수아 학우께서 발언해주세요.



(▲장혜정[의류 2], 윤유진[행정 2], 이현경[경영 2])

이수아(행정 2) : 저는 북한과의 신뢰프로세스는 지금 당장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햇볕정책이나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대북정책 등 모두 비난을 면치 못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도 구체적인 계획과 대비 없이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전의 정책과 이름만 바꿔놓은 허울 좋은 명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정책적인 제재보다는

거래 식의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여론에서는 핵을 수입하든지, 자국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핵을 실질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핵 보유기술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더 이상 핵은 도발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적으로 북한의 무기인 핵이 더 이상 무기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고 북한에게 필요한 돈을 주는 대신 핵을 놓는 방법 등의 거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경림(행정 2) : 이수아 학우께서는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싶다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강력한 제재보다는 북한이 핵이 더 이상 도발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할 수 있는 거래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미선 학우께서 발언해주세요.

설미선(행정 2) :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당장에 구축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온순한 대북정책에서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서 떼쓰는 것을 봐주지는 않겠다 식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북한의 도발이 심해졌었습니다. 저는 이번의 북한 도발 역시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걸림돌인 핵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간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유진(행정 2) : 하지만 북한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모두 군대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고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참여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도발은 멈출 수 있지만 나중에 일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미선(행정 2) : 저도 대부분의 지원이 군대 예산으로 편중된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하는 확인 시스템은 우리나라 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들에서 관리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지원이 군비로 편성되는 것을 막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탈북자 수기를 읽어본 결과, 북한주민들은 현재 전쟁이 나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결국 죽기 때문에 전쟁에 찬성하는 입장도 다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저는 강력한 제재를 위해 지원을 100% 차단하는 것보다는 당장 배고픈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고 북한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경림(행정 2) : 설미선 학우께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법은 강력한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제 이현경 학우께서 발언해주세요



(▲윤유진[행정 2], 이현경[경영 2], 송경림[행정 2], 강지민[서양화 2], 박민지[공예 2])

이현경(경영 2) :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와 사상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서 통일을 구축하기 위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우, 우리나라도 죽고 자신들도 죽자는 같이 죽자 식의 도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국민들의 생각이기 보다는 지도층과 기득층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도 역시 필요하지만 북한의 국민들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영상을 국민들에게 보내어 의식개혁이 신뢰 회복의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설미선(행정 2) : 제가 반론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행정학과 수업시간에 탈북자 감독님을 만나 북한의 행정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북한 내의 미디어는 굉장히 검열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원수가 원하는 대로 등급을 매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은 도구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영상이 전달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정(의류 2) : 하지만 북한 내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비밀리에 퍼지고 있고 요즘은 USB 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비공식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유진(행정 2) : 하지만 그러한 영상들이 비밀리에 퍼지는 것은 상위계층의 자제들이 시청하는 것이지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아(행정 2)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서로 도청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제가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라디오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북한 방송이 잠깐 들리거나 하는 경우도 경험한 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에게 퍼지게 한다면 북한이 감청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라디오를 통해 퍼뜨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전에 많이 쓰던 방법으로 소위 삐라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면 전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미선(행정 2) : 하지만 저는 이러한 방법이 과연 우리나라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일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상매체를 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달도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지도층에게 걸린다면 우리나라와의 감정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유진(행정 2) : 또, 현재식량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영상매체가 과연 보이기는 할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이수아(행정 2) : 식량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대북제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북한에게 지원해주는 액수는 커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본다면 북한과의 관계는 얼만큼 지원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표면적인 입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제재한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가 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북한을 포용하고 나가겠다고 주장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더 큰 물자를 받을 수 있다고 북한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입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정치방향인 것 같습니다. 즉,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북한에 도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미선[행정 2], 장혜정[의류 2], 윤유진[행정 2], 이현경[경영 2]), 송경림[행정 2], 강지민[서양화 2],이수아[행정 2])

송경림(행정 2) : 자, 여러분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장혜정 학우, 윤유진 학우, 강지민 학우, 박민지 학우, 이수아 학우의 경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천하는 첫 걸음은 강력한 제재든 북한과의 거래를 하든 방안을 강구하여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미선 학우와 이현경 학우께서는 북한의 도발의 원인을 북한주민의 가난과 무지에서 찾으면서 그들에 대한 의식개혁과 실질적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의 결론을 내리자면 북한의 도발은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발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을 보유하면서 핵 실험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난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북한의 다수의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면 북한의 도발은 더 강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에 대한 제재는 강력하게 하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1 차 서울여대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⑤ 총신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사회자 : 2012 년! 한국의 박근혜 정부, 중국의 시진핑 시대, 일본의 아베 정권이 막을 올리며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3 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에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당장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감안할 때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선진화포럼 제 72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는 한·중·일 새로운 지도자 체제에서의 동북아 정세-박근혜 정부의 대외/대북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대북,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취해왔던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발제하신 유호열 교수님께서는 이제는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제일 가난한 국가고 우리를 결코 위협할 수 없는 국가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핵 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 정세 및 국제 정세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대와 낙관적인 방법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무조건적인 지원정책과 같은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노지애(유교 3) :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투 트랙 정책 즉, 당근과 채찍 정책이 나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서도 이 정책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이삭(사복 3) : 연평도, 천안함 사건 등 과연 최근 5 년간의 대북정책이 긍정적이었나라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홍예지(아동 2) : 저도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기보단 평화를 통해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를 보면 북한과 남한은 애초에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불신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자 : 다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유화도 강경도 아닌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다들 공감하시는지요?

김재훈(유교 3) : 오늘 자 신문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유화와 강경정책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신문에서 이런 칼럼을 보았습니다. 유화와 강경정책이 모두 병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를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강경과 유화 모두 병행해야 한다고 보기도 하는데 두 가지 모두 병행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고르라 하면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햇볕정책은 이산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강경책을 유지하며 북한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북한은 우리에게 적국이면서도 형제인 모순적인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북한이 생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김혜정(유교 2) : 지금 북한이 우리와 협의를 모두 깨겠다고 하는데 6·15 평화선언은 깨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일이 직접 합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국 모두 6·15 평화선언을 이행하면서 유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이삭(사복 3) : 6·15 나 10·4 선언에 관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합의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구요.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이상 북한과의 협상은 없다.'라는 식으로 북한과 직접적인 상호 비방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은 점점 더 자극을 받게 되었죠.

이민효(역교 2) : 과연 10 년 전, 대북 유화정책을 펼쳤던 때에 북한과의 신뢰관계는 원활했을까요? 그래서 그 때의 자료를 찾아본 결과, 김대중 정부 때도 북한이 NLL 을 침범하고, DMZ 에서 기관총을 발사하는 등 계속적인 남·북간의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 물론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햇볕정책 또한 남·북 관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판문점의 직통연결도 끊겼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죠. 어쨌든 저는 10 년 전의 북한의 관계와 지금의 관계가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두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신뢰 프로세스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는데, 아직 박근혜 정부가 초기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조현빈(아동 2) : 다들 우리나라의 정책을 기준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것에 있어 바위산인 북한에게 햇볕을 쐬어도 녹지 않았고, 망치로 두드려도 깨지지 않잖아요. 처한 상황에 따라 북한은 힘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는데, 북한은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최근 5 년은 때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북한은 체제 유지 등의 목적으로 핵실험, 연평도 포격을 했는데 그 때 우리는 강경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정책을 탓할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북한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신뢰 프로세스를 한다 해도 귀를 막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에요. 결국 북한에서 근복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정책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아동 4) : 저도 조현빈 학우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던, 북한이 신경 쓰는 부분은 미국, 중국 등 패권국과의 관계, 그리고 체제 유지에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우리의 정책에 따라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햇볕정책이건, 신뢰 프로세스, 다른 어떤 정책이 나와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이삭(사복 3) : 김정은이 강경으로 나가는 이유 중 하나는 대내외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일거에요. 특히 내부적으로는 핵실험을 하는 등 뭔가를 보여줘야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김정은 체제를 대하는 데에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렵고 대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이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예지(아동 2) : 동의합니다.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북아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고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민효(역교 2) : 협력이 어려운 것이, 북한은 우리에게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북한이 정전협정을 깨겠다고 휴전협정을 맺을 때, 북한과 유엔이 협정을 맺었고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은 협상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면 북한에서는 '왜 너희가 뭐라 하냐'는 식이죠. 동북아 문제만 놓고 보아도 협력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에요. 중국은 북한이 없어지고 새롭게 통일한국이 된다면 자신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상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때 김정일과 평양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 선언에 기반을 놓고 대화로 한편으로는 압력,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과 일본 간에는 납치문제, 제일동포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죠. 결국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박이삭(사복 3) : 북한의 태도는 '자신들의 태도를 유지하겠다'에 있는 거죠. 중국과 일본이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과는 먼 얘기 같은데요? 중국은 북한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기 옆에서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아베 총리는 군대를 창설하고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핵실험이 문제인 거죠. 설상 이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 문제에 대한 동북아 협력의 공통 의제는 있다는 것이죠.



사회자 : 지금까지의 대북정책들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면서 각자 유화 또는 강경에 대한 선호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북한의 본질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미비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진 학우님과 조현빈 학우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정부의 정책에 상관없이 북한은 자신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박이삭, 홍예지 학우님께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문제로까지 전환시켜 주셨어요.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대북관계를 풀어가자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게 북핵문제잖아요. 이번 3 차 북핵사태는 대북 외교를 정상화할 좋은 기회이자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핵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수진(아동 4) : 북핵 문제에서의 핵심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강경책을 통해 핵실험을 하는 자금의 원천을 봉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란에서 이번 3 차 핵실험의 자금과 기술을 제공했다는 뉴스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자금 확보의 길이 아닐까요?

조현빈(아동 3) : 저는 북핵을 제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만의 힘으로는 북핵문제 해결 못해요. 중국은 경제적으로 크고 북한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에요. 중국이 눈감아주니까 제재도 흐지부지 된 것 아니겠어요?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시진핑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가 끈끈해진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효(역교 2) :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이 처음에는 여러 갈래였잖아요. 소련파, 중국파, 국내파로. 김일성이 숙청하고 우리 식의 공산주의를 만들겠다고 했죠. 북한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중국과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거에요. 아무리 혈맹이라고는 하지만 지원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나폴레옹이 영국에 대해 봉쇄할 때 실패했듯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 해도 어디서든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스위스은행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어디서든 자금 줄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 조현빈 학우께서는 북핵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민효 학우께서는 중국의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유성옥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판단해서 ‘핵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를 위해 북한의 개혁 개방이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겠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조현빈(아동 2) : 동의합니다.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숨통을 놔준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쪽에서 중국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할 때에는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북한이 경제협력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은 중국이라 생각해요.

이민효(역교 2) : 중국에서는 페이스북도 자유롭게 못하고, 자신들만의 SNS 가 있잖아요. 정부에 어긋나는 의견을 쓰면 삭제되고 말이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국민들에 대해 통제적인데요?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깬거죠.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거죠?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북한이 만족을 할지 회의감이 드네요. 개혁 개방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겠지만, 통일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홍예지(아동 2) : 북한=(equal)핵, 김정은=김정일=김일성이잖아요 북한 내에서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통일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북한 내부에서 바뀌지 않는 한 외부적인 강압이나 국제공조를 한다 해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박이삭(사복 3) : 북한에 대한 핵문제는 포기를 넘어서서 관리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핵을 포기시키는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이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민효(역교 2) : 관리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제 북핵문제는 퍼줘가며 달래거나 안줘가며 윽박지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핵을 북한이 이제 와 선뜻 버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자 : 북핵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박이삭 학우님께서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포기가 아닌 관리 단계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홍혜지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내의 민주화 없이는 통일이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변화하기만을 기다리기엔 급박한 상황이라 생각해요.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이삭(사복 3) : 얼마 전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탈북자들이 놀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 생각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래요. 당연한 건데요. 제가 다 놀랐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체제의 우위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혜정(유교 2) : 문제는 북한에서 그런 통로를 다 막고 있다는 것이겠죠.

박이삭(사복 3) :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사 후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나눠준대요. 그런데 초코파이 1 개 가격이 북한에서 두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측 근로자들은 이걸 먹지 않고 아껴뒀다 가족들에게 주거나 물물교환용으로 이용하기도 한다는데 이런 식의 접근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작은 것을 통해 우리의 체제 우위성을 배우게 되는 거죠. 추상적이지만 한걸음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홍예지(아동 2) :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생생하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비밀리에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대요. 중국과 북한은 밀수 등 비밀리에 만날 수도 있다고 해요. 만나고 만나다 보면, 퍼지고 퍼지지 않을까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해요.

김재훈(유교 3) : 동의합니다. 북한의 내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금강산 산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달러가 유통되고, 드라마도 유통되면서 북한에 시장경제 체제가 들어서게 해야겠죠? 양이 차는 그 시점에 북한의 정세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효(역교 2) : 아랍 같은 곳, 시리아를 보면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될 것 같은데, 북한은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북한 시민들의 생각은 '남한은 잘 사는데...'에서 그친다는 거죠.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외부에 계속 도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아마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통제를 더 하겠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버텨낼까 그게 관건인거죠. 지도층이 경고를 하면, 밑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비밀경찰이 숙청을 할 테고, 까딱이라도 들키면 시민들이 죽는거죠.

김혜정(유교 2) : 하위계층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거에요. 중위계층들이 깨달았을 때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우친 지식인들이 의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주변에서 변화의 기운이 넘칠 때 혁명의 기반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지애(유교 3) : 동의합니다. 통일을 하는 데 있어 우리는 독일의 경우보다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 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압박감을 견딜 수 있을지, 우리나라와 북한의 소득격차를 봤을 때 서로 통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통일을 반대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구요.

김재훈(유교 3) : 신문에서 안타까운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탈북과정이 매우 힘들었음에도 한국에서 너무 가난해서 자살까지 하게 된 탈북자의 사연이에요. 통일이 된다면 카스트 제도가 생기지 않을까요?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사회자 :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통일 이후의 문제까지 이야기해주셨어요.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의 목표는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행복한 통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경제 공동체를 건설한 뒤, 정치 통합까지 이루자는 내용이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잘 진행된다면 남북간의 경제 협력과 북한 민주화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의 통일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대가 듣고 싶어요.

조현빈(아동 2) : 박근혜 정부의 통일 밑그림은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남북간 합의 하에 만든 조항들을 하나씩 지켜가는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큰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겠죠.

이수진(아동 4) :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5 년 안에 끝낼 정책이 아닌 계속 흘러갈 큰 물이라고 생각해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이전과 비교하여 좀 더 거시적인 대북정책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이민효(역교 2) : 동의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는 중장기 전략 부재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해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정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끝이 나는 정책이 아니라 통일까지 바라보는 중장기적 통일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 정리할게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네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며 두 정책 모두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과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불어 북한의 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고 이를 위해 북한 민주화,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깨닫게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실질적인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진화 과제 38: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

(제 98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강유정(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최근 한국의 청년사회는 헬조선, 수저계급론, 지옥불반도 등과 같은 신조어로 대변됩니다. 계속 증가하는 청년실업률, 지속적인 저성장을 배경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됨에 따라 언어가 경쟁이 고도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은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한국 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비교경쟁사회와 상속으로 인한 서열사회, 학습된 무력감으로 인한 절망사회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다배분 보상과 상대적 배분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토론자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노동시장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로자 간 양극화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진정한 노동개혁, 진정한 CSR, 진정한 상생나눔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론자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조적 원인으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사회적 우연성과 자연적 우연성이 사회적 성공에 끼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수빈 학생은 ‘수저계급론’에 희망이 없는 좌절감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상생적 자본주의, 그리고 긍정적인 보상구조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이경한 학생은 절망 사회가 된 원인 중 특히 저성장을 강조하며 과거와는 달리 양질의 일자리에 비해 인력이 초과하는 현상, 즉 양질의 일자리와 인력이 '미스 매치'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중 대표적으로 좌절감을 강요하는 서열화 된 교육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연한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요하는 학교분위기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창의·인성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최근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풍토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입시위주의 교육구조를 개선시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창의·인성교육은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교과별 창의·인성 수업 모델을 활용해야 합니다.

핀란드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창의·인성 수업 모델의 좋은 예로서, 지역의원들과의 정치토론을 진행하고 지역소방서나 경찰서 등의 기관들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역사회와 협동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으로 직업체험을 구성하고, 교과과정 내에서도 현장 중심의 다채로운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으로는 향교 체험활동이나 자연체험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활동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풍토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영화나 연극 음악회 등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미흡하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차원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창의·인성 현장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창의·인성수업 연구 활동과 연구회 간의 정보 공유와 수업 모델 일반화 또한 중요합니다. 교육과정과 교사의 수업방식이 상반되지 않고 통일되어야만 창의·인성교육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조선과 수저계급론으로 대변되는 청년사회의 현실은 교육현장부터의 변화로부터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학교풍토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학생들의 관심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공수진(광운대학교 행정학과)



힘든 현실을 반영하는 신조어 '헬조선'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헬' 즉,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모습은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선진화포럼은 제 98 차 월례토론회의 주제를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로 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대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토의해 보았습니다.

우선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는 지나친 비교·경쟁사회, 비정상적인 서열화 사회, 또한 심리적으로 절망적인 사회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 기회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헬조선을 힐조선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배분 보상과 상대적 배분을 강조했습니다.



절망적인 사회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헬조선의 처방은 제도의 질 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합게임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한 공익과 법치의 강조가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공익을 추구하는 것일 때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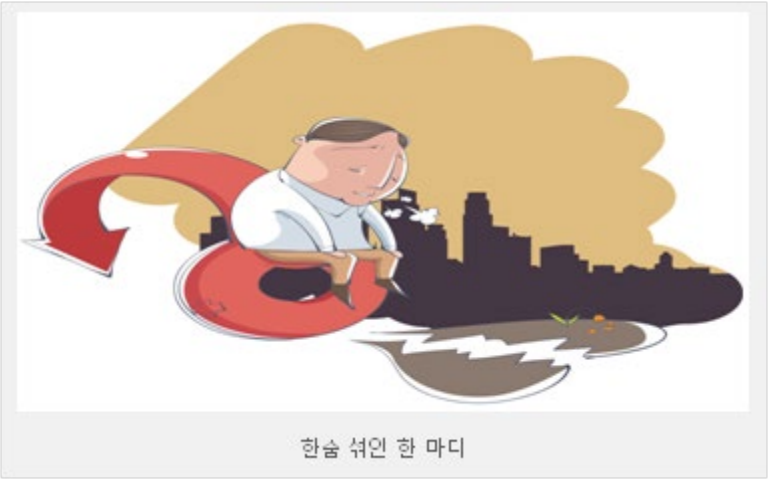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중노동시장의 구조가 헬조선 심리를 확산시킴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Heal 을 넘어서 Fair, Care, Share 의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빈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학생은 젊은이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보상이 가능해지도록 분배구조가 변화하여야 할 것이고, 승자독식주의가 아닌 상생적 자본주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한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학생은 한국 사회가 절망 사회가 된 이유로 저성장, 그릇된 언론, 전교조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한다면 국민 통합이 가능해지고 헬조선이 아닌 헤븐조선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0 세대에서 헬조선,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한국의 현재 상황은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헬조선을 힐(Heal)조선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헬조선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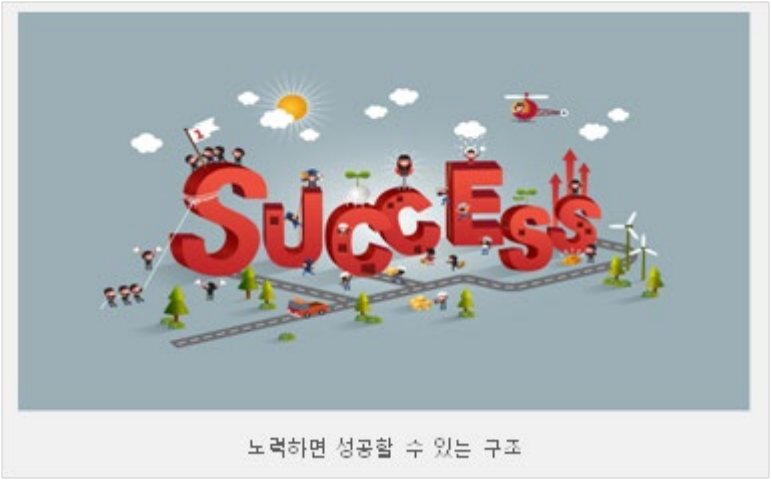
그러나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없는 노력에 지쳐버린 사람들의 한숨 섞인 한마디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한숨 섞인 한 마디

절망한 개인들이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지 않고, 착취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활동이나 참여를 중지하게 되고, 결국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건전한 경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개인들에게 노력을 요구하기 이전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구조

공정한 사회란 능력이나 역량이 유사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유사한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우연성 즉, 그 사람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등에 의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어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익과 법치를 강조하되,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다수의 이익과 의견뿐 아니라 소수의 이익과 의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서열화를 없애 베이비붐 세대의 고착화된 연공 서열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관료제 각 계층을 없애고 팀 구성원 관계를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간주하고 조직의 업무는 팀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분권화된 의사결정과 권한이양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면 구성원들은 조직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BRAVO 세대는 1980 년대 전후로 출생한 1 가구 1~2 자녀 시대에 기술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성장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평가와 보상에 민감하여 자신의 노력이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BRAVO 세대가 헬조선이라는 말에 휘청거리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중요합니다. 또한 여론을 왜곡하지 않는 언론과 비판적 감시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형성될 수 있는 건전한 문제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가진 사회 세력들의 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③ 권새암(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헬조선으로 표현되는 절망.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구조라고 여기면서,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은 계급 구조가 고착화되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무엇인가를 시도해보기도 전에 의지를 잃고 포기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현재의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신조어는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헬조선이라는 용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암울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고찰,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제 9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헬조선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곽금주 교수는 비교 심리에 관한 실험을 제시하면서 본래 서열화나 비교가 당연한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서열화,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보상 빈도를 늘리고 상대적 배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조준모 교수는 한국노동시장이 과도하게 경직,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한 노동 시장 간 불평등 심화, 차별 심리가 심각해진다고 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국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창원 교수는 시장경제에서 게임의 규칙을 공정하게 해야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회에 적극 참여,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집안, 사회적 배경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 공익과 법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빈 학생은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보상을 주도록 분배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과도한 승자독식주의가 아닌 상생적 자본주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경한 학생은 과도하게 언론에서 헬조선이라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현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여러 사회 집단, 단체는 한국 사회가 절망 사회라고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의 토론 내용에서 볼 수 있듯, 한국 사회에 만연한 헬조선 풍조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생겨난 것입니다. 노동시장 간의 격차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에 비해 보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낙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취업난 문제는 그 동안 인력 공급 구조가 잘못되어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국은 제조업이 주력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2000 년대부터 이공계보다는 인문사회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급증하였고, 이 때문에 현재에 와서 인문사회 인력 공급은 과포화 상태에 이르고 이공계 인력 공급은 미달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공계 인력 공급을 보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마이스터고 정책을 잘 이어받아, 고등학생들을 우수한 기술숙련공으로 많이 육성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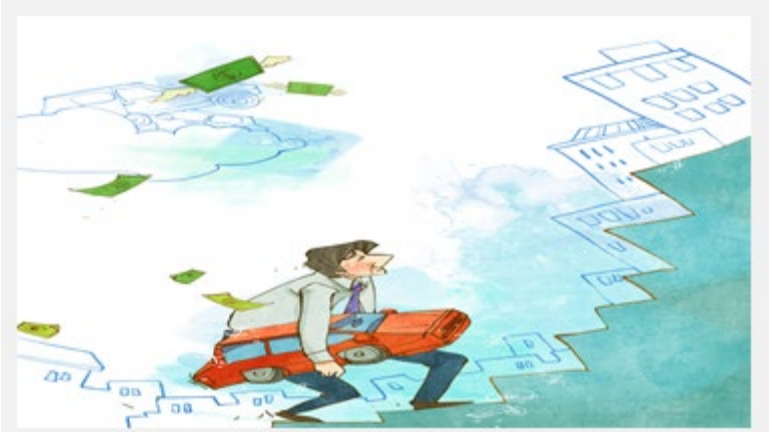
이공계 인력풀 육성, 인력 수급 불균형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문사회를 전공하는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이공계 교육을 보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의 SCSC(Samsung Convergence Software Course)처럼, 컴퓨터 소프트웨어 능력을 함양해준다든가, 공학적 소양을 배양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공계 지식을 홀로 공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교육 프로그램,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개설하여 조금이라도 노동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일자리 문제를 어느 정도라도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인력 수급 문제만을 해결한다고 해서 헬조선 풍조가 바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 시장 간의 격차, 보상 문제, 정신문화적 여유 등 많은 요소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영역도 차근차근 개선해나간다면 헬조선을 힐조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④ 권혁찬(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근 대한민국에서 불고 있는 헬조선 열풍,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매우 높은 것이 올해 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청년들의 반복된 취업 실패는 현 상황에 대한 비관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재산의 생성에서 부의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대학의 진학 역시 재산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조사가 발표되면서 이른바 '수저계급론'이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조롱과 함께 '헬조선'이라는 자조섞인 단어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과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 라는 주제로 제 9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곽금주 교수는 헬조선의 원인으로 다양한 심리학적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현재의 문제는 타인과 과도한 비교, 비정상적인 서열화 등에 있다고 보고 분배(Allocation)을 중요시하자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토론자인 이창원 교수는 헬조선의 처방으로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게 되면 다른 한 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제도의 질 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합게임(Positive Sum)을 구현하기 위해 공정한 게임의 규칙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준모 교수는 헬조선의 원인을 노동시장에서 차별로 돌리는 심리와 나와 남과의 생산성 격차는 보지 않고 임금차이만 비교하는 심리 등을 지적하고 진정한 노동개혁, 진정한 CSR, 진정한 상생나눔이 확산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생 토론자로 나섰던 김수빈 학생은 현재의 헬조선 신드롬 확산이 아무리 노력해도 수저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개인이 노력을 통해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경한 학생은 현재 비관적인 인식 확산의 원인을 언론과 전교조로 보고 청년들은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시민단체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을 바로잡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헬조선 탈출은 요원하기만 하다.

제가 생각하는 헬조선 신드롬의 원인은 '노오력'해도 '수저'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저성장과 일자리의 극심한 부족함, 비관적인 미래전망 때문입니다.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헬조선 신드롬에 대해 일부는 "헬조선 열풍은 불평분자의 마음에나 있다"고 비판하는 측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비교하려는 마음이 강한 한국인에게는 심리학적으로 절대적인 수준보다 상대적인 격차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현재 사회의 주축이 되는 80 년대 고도성장기에 취업한 이른바 386 세대라 불리는 기성세대의 취업시장과 비교하면 저성장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현재의 고단함이 경제성장기 이전 비참하던 시절보다도 젊은이들의 눈에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는 80 년대 후반부터 노동계의 권력은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임금과 생산성의 급격한 격차를 만들어냈고, 이 격차는 IMF 당시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상은 최상층 귀족 노동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탈을 쓰고 기업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경제학의 이론에 따르면 강력한 노조에 소속된 노동자의 높은 임금과 강력한 고용안정성은 실업자와 노조에 속하지 못한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현재 기업에 취직하는 사회초년생이(바로 우리세대입니다!) 은퇴할 즈음인 2040 년~2050 년대에는 고갈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내년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현재의 복지수준 지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급격히 증가하여 2040 년대에는 이미 그리스 수준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증가하는 국가채무, 고갈되는 연금, 경직된 노동시장을 과격하게 비판하자면 현재의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빌린 빚으로 '빚잔치'를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기성세대의 양보와 새로운 혁신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성세대의 양보와 혁신을 통해 희망을 되찾아야 한다.

첫 번째는 기성세대의 양보로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유연화로 양보하길 제안합니다. 고용유연화라고 하면 흔히 해고의 유연성만을 생각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임금의 유연성입니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연공서열제를 생산성만큼만 임금을 지급받도록 구조개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퇴시기가 다가올수록 고용주의 부담이 상승하는 연공서열제와는 달리 자신의 생산성만큼 임금을 받는다면 은퇴시기가 다가오더라도 기업에도 부담이 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도의 고용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복지제도에도 양보해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받을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고 국가재정을 파탄시키며 벌이는 빚잔치는 결코 지속가능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케인즈의 말대로 장기에 우리는 모두 죽기에 괜찮은 것일까요?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젊은이들의 은퇴시기엔 나라곳간도 거덜나고 국민연금도 없다는 소식을 들으며 어느 누가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둘째는 우리 미래를 위한 혁신으로 정부는 우선 기업을 압박하여 얻은 홍보성 일자리 대체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포장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기업이 학교를 세운다고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무리해서 과다고용을 한다고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일자리의 창출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신규 산업이 생겨나는 상황 끝에 얻는 것입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한다는 듣기 좋은 명분하에 시장자체를 위축시키고 고사시키는 일도 당연히 그만두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살린다며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시장을 고사시키는 행위는 현재에도 우리의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신규사업과 시장진출이 제한당할 때 반대로 중소기업은 장려되고 보호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는 대기업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싸구려 일자리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의 유산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나 전문직은 강력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다락같이 높은 진입장벽을 치며 인원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직되고 수직적인 기업문화와 권위주의에 의존하는 업무처리방식은 우리 기업들의 혁신을 앗아갔으며, '우리가 남이가' 식의 그릇된 공동체 주의는 우리를 지연, 학연, 각종 비리에 연루시킬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힘들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암울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면 영원히 헬조선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세대와 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해 기성세대의 통 큰 양보와 진정한 혁신을 바랍니다.

⑤ 김다솜(건양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 어려운 경제

최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고성장기에 형성된 많은 관행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 일각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hell 조선'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의 뜻은 최근 등장한 인터넷 신조어로서 헬(Hell : 지옥)과 조선의 합성어로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재 젊은이들이 사회에 대해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수저론'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사회적인 위치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회의감에 젖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성장동력인 젊은이들의 좌절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한국 현안 이슈에 주목해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도 20 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98 차 월례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대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발제자인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hell 조선'의 원인으로 한국사회가 지나친 비교경쟁사회, 심리적으로 절망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헬조선을 힐조선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보상 기회의 다양화와 계급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배분을 통해 권력이 아닌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인 김수빈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학생은 상생적 자본주의를 이루어야 하고, 과거 교육처럼 개인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와 실패를 받쳐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 'hell 조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경한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학생은 'hell 조선'의 원인을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 그릇된 언론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hell 조선'의 원인을 나와 남과의 생산성 격차는 보지 않고 임금차이만 비교하는 심리 등을 지적하고 진정한 노동개혁, 진정한 CSR, 진정한 상생나눔이 확산되어야 나라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토론자인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hell 조선'의 처방으로 제로섬 게임이 아닌 시장경제 제도의 질 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합게임을 구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공정한 게임의 규칙

최근 사회적 문제를 다룬 인터넷 기사를 클릭하면 댓글에서 거르지 않고 보이는 'hell 조선'이라는 단어와 부정적인 말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유시장경체제'의 '경쟁'이라는 게임규칙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이 게임에 참여를 중지하게 만들고 비교우위에 있던 구성원들도 경쟁이 불필요해지면서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중지하게 하여 사회의 활력을 잃게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즉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게 되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제도의 질 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합게임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례로 혹시 유치원 입학 추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치원 원아모집기간이 되면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저렴한 공립유치원에서는 추첨을 통해 유치원 입학이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떨어진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비싼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지만 이마저도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도 아니면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는 유치원에서 받아야 할 교육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못간 아이는 학교에서도 뒤쳐질지 모릅니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각 지역마다 일정한 공립유치원을 더욱 늘려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지역 사립유치원을 인계하여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유치원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소비자인 학부모들은 필요한 유치원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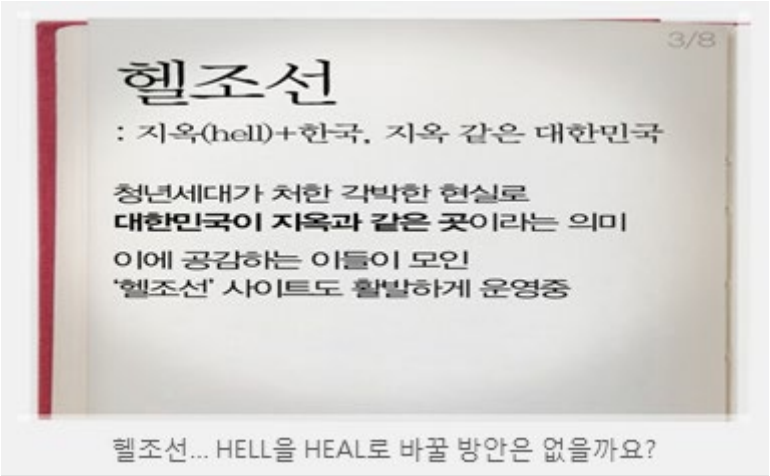


모두가 행복한 헬조선을 만들자

이러한 제도적 질 개선은 사회적 갈등의 구조적인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경쟁에 참여하기도 전에 좌절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제 더 힘차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대한민국은 더 이상 ‘hell 조선’이 아닌 ‘heal 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진정한 경쟁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⑥ 김덕규(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헬조선... HELL을 HEAL로 바꿀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단기간 급성장한 대표적인 나라이지만 지금은 그 후유증과 더불어 정신적 피폐함이 자리잡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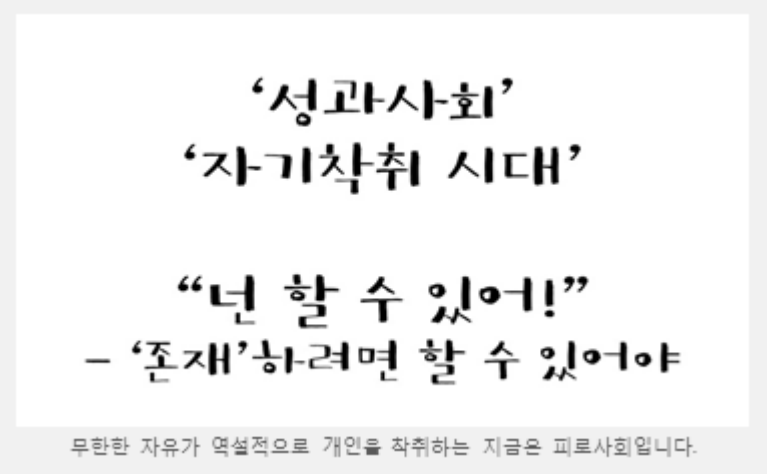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헬조선’이라는 인터넷 신조어와 수저계급론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등 우리 사회를 자조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 라는 주제로 제 9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현대 젊은이들은 과거 대학생들의 오프라인 시위 문화와 달리 온라인 시위를 통해, 즉 SNS 를 활용하여 사회에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비교경쟁사회, 서열 사회, 절망 사회로 치닫는 HELL 조선을 HEAL 조선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多배분 보상과 상대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분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성장의 명암을 제시하면서 Fair, Care, Share 라는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더 나아가 구조적 논의를 통해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공정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공익 추구와 법치의 강조를 통해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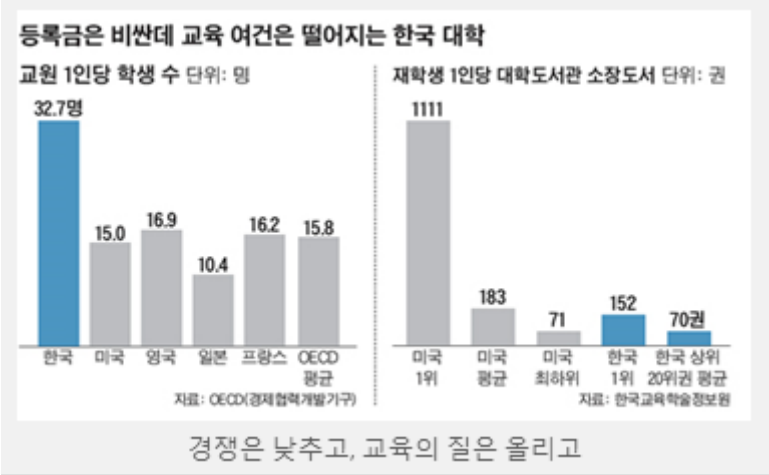


곽금주 교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비교경쟁과 서열 문화가 과잉되면서 절망 사회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병철 교수의 저서 '피로사회'에서 보듯이 사회 구조가 개인을 착취하는 순간을 넘어 언젠가부터 개인이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무한한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 속에서 개인은 큰 부담을 느낌과 동시에 우울증을 겪고 심화될 경우 낙오자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경제 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한 경제적 빈부격차와 사회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개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패닉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곽금주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언급한 내용, 즉 한국인은 다른 국민에 비해 비교의식이 유난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비교 욕구를 일반적으로 뛰어넘는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지나친 경쟁교육 때문입니다.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사회적 배경도 개선해야 하지만 저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치료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식 교육 이용권(voucher)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바우처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불을 보증해주는 증서로서 일종의 이용/교환권입니다.

학생들에게 수업료 쿠폰을 주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 학교 재정은 각 학교가 받은 수업료 쿠폰 액수에 비례하여 국고에서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학생이 아니라 각 학교가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하는 것이지요.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모든 계층이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의 '학교 바우처 제도(school voucher)'는 저소득층 학생의 사립학교 이용 지원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바우처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이 자율적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이 과열 경쟁으로 학습된 실패를 경험하는 상황이 아니라, 학교가 더 좋은 교육을 위해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좋은 대안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심각한 이기주의가 대학교 캠퍼스에 자리 잡았다는 소식이 매해 초에 들립니다. 학생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비극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 또한 심심찮게 등장하는 등 지나친 경쟁심을 부추기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덴마크의 인생학교: 바우네호이 애프터스쿨 (Baunehøj Efterskole)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참교육을 하는 인생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뒤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해,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탐색하지 못한 채 청소년기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암기식 교육에 매달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잘 문제를 푼다고 보다 완전한 인격체라고 볼 수 있나요? 오히려 문제 푸는 기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반드시 반성해야 합니다.

덴마크의 바우네호이 애프터스쿨(Baunehøj Efterskole)이라는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15-17 세의 100 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국가가 지원은 하지만 학교운영과 교사채용과정 등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학교에 일임하는 학교입니다.

국가의 간섭은 일절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서의 새집 짓기, 목공예, 승마,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학교생활이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미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것 아닐까요?

삶에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스피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인격체도 정립되기 이전에 계속 최연소라는 말만 강조할건가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나서 달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을 없애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싶으면 이러한 인생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인생학교가 개인을 바꾸고, 이러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알게 되면 현재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취지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누구나 대학을 가야 한다는 잘못된 사회 인식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위인들은 모두 훌륭한 교육(좋은 학교와 우수한 성적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을 받았고, 범죄자들은 불우한 교육, 특히 적절치 못한 가정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질 좋은 교육을 위한 교육이용권(voucher) 제도, 인생학교 설립이라는 교육 혁명을 통해 HELL 이 HEAL 이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꿈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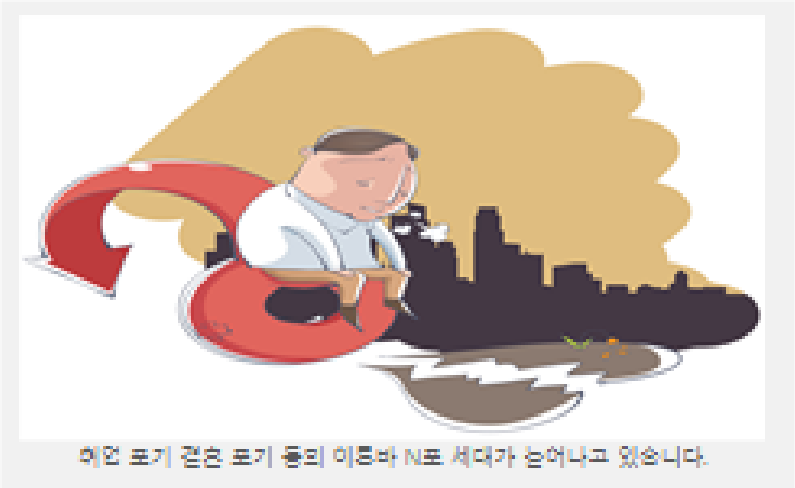
⑦ 나종문(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현재 한국 사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숟가락 계급론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수저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반면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여기며, 노력을 강요하는 것을 '노오력'이라고 반박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기도 전에 의지를 잃고 포기하는 이른바 3 포, 5 포, 7 포, N 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의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한민국은 살기에 좋지 않은 국가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용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선진화 포럼에서 제 98 차 월례 토론회를 열어 헬조선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곽금주 교수는 비교 심리에 관한 실험을 제시하면서 본래 서열화나 비교가 당연한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서열화,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보상 빈도를 늘리고 상대적 배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조준모 교수는 한국노동시장이 과도하게 경직,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한 노동 시장 간 불평등 심화, 차별 심리가 심각해진다고 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창원 교수는 게임의 규칙을 공정하게 해야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회에 적극 참여,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집안, 사회적 배경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 공익과 법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빈 학생은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보상을 주도록 분배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과도한 승자독식주의가 아닌 상생적 자본주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경한 학생은 과도하게 언론에서 헬조선이라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현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여러 사회 집단, 단체는 한국 사회가 절망 사회라고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헬조선 풍조는 노동시장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막상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도 자신의 공로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청년 실업의 문제를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고, 설령 취업을 한다고 해도 정년이 되기 전에 회사를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힘들고, 취업을 해도 금방 나가야 하니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취업할 사람은 많지만,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부족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정된 자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과도한 경쟁을 따라가지 못하는 청년층이 결국 청년 실업, 취업 포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들에게 중소기업에 다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재에게 좋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대기업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은 자금이 부족하고 정부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에 비해 대우가 낮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소기업의 대우를 높이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는 너무 많고, 이를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정부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는 고용시장을 시장에 맡겨 경쟁을 유도하여 대우를 높인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은 고용시장을 해외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최근 해외 기업에서 국내 인재에 엄청난 대우를 약속하면서 데려가는 상황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은 수준이 아주 높지만,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해외로 눈을 돌려 일자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의 헤드헌트 회사들이 소개해주는 회사는 대부분이 국내 기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헤드헌트 회사가 해외 기업을 소개해서 청년들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 경쟁하면 일자리 풀이 늘어남과 동시에 인재에 대한 대우 역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업은 경력직 채용을 늘려 중소기업의 메리트를 늘리고, 해외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한다면 충분히 고용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 기업들이 경쟁을 해야 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기업이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재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고 기업은 이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뽑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역전시켜 기업이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로 만든다면 청년 실업 문제와 동시에 정년 이전 퇴직 역시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한다고 해서 헬조선 풍조가 바로 사라지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신문화적 여유나 금수저 논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 둘씩 해결해나가면 헬(Hell)조선 풍조를 언젠가는 힐(Heal)조선 풍조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⑧ 박상희(한성대학교 무역학과)



비정상적인 비교. 서열화 사회와 절망사회는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는 계속된 저성장 속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 사회의 민낯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인터넷용어에서 점차 네티즌과 언론의 보편적인 용어로까지, '헬조선'이라는 말까지나올 정도로 비관적인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98 차 월례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발제자이신 곽금주(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모순된 현실에 대한 청년들과 언론의 자조적 표현은 우리사회가 비교, 서열화사회의 부정적인 기능과 절망사회를 대변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다배분보상과 상대적배분을 통해 힐조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준모(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중노동시장의 구조가 헬조선의 심리를 확산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진정한 노동개혁과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체제의 경쟁을 지속시키기 위한 '게임의 규칙'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김수빈(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학생은 취준생들이 공무원과 공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저녁있는 삶'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공무원 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한다며 개인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와 실패가 받쳐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경한(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학생은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주위에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없다면서 '언론'이 비관적인 상황을 조장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보고 자신이 정말로 계층사다리를 이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아무래도 보편적이면서도 한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주제인만큼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개인에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탓, 사회탓을 하지 말라고 하기엔 이 현상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개인의 탓으로 전가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언론, 정부, 기업 등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근본적인 현상과 원인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단순히 개인과 사회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나아지거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희망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을 보았을 때 기성세대에 대한 갈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저성장의 침체로 인해 기업이 고용인원을 줄이고 일자리미스매칭으로 인해 체감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과열된 경쟁 속에서 스펙을 쌓기도 하지만 취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니트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직된 기업문화나 열심히 일하는 대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민을 가려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국가를 위한 일이 더 중요해 획일화된 제도가 가능했지만, 오늘날은 개인의 삶이 더 중요시되어 다양화된 사회에 걸맞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사회에 맞추어 제도도 공정성을 기반으로 '다양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진로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특성화된 대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직업전문대학교와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뚜렷히 구분하여 대학의 다양성을 시도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에게는 뚜렷한 진로와 방향을 가지고 대학교에 올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흥미를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직업상담사를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청년을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해 힘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 세로 늘어나는데, 한 고용자가 1 년 정년이 더 보장될 때마다 청년 3 명이 고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동개혁은 청년들, 더 나아가 우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노동개혁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노동개혁이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문제에 대해 유연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스펙중심이 아닌 능력 성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을 짧게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경로를 막지 않도록, 고용한 비정규직 중 몇 퍼센트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수를 늘림으로써 실업률을 감소하는 것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진로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 맞는 노동 일자리를 창출하여 다양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합니다.

어쩌면, 대학생으로서 현재 우리는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꾸기는 힘들지 모릅니다.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대로 정책이 바뀌어지고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고 비관만하는 대신, 개인탓으로 사회문제를 전가하는 대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를 비관하는 태도보다 그것이 나온 근본적인 문제와 배경을 살펴본다면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⑨ 송지나(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만연으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확산되고 있다

연말연초가 성큼 다가온 지금, 올 한해 뉴스댓글과 방송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를 꼽자면 바로 '헬(HELL)조선'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많이 공감하는 단어일 텐데요.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메르스사태가 발생했을 때 SNS 를 통하여 단어의 사용의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헬(HELL)조선'이란 헬(HELL: 지옥)과 조선 의 합성어로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이며 이 단어의 사용범위는 청년실업문제와 경제적불평등 등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마주친 불합리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기에 이를 만큼 국민 대다수가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되는 단어, '헬(HELL)조선'의 원인이 무엇인지, '헬(HELL)조선'이 아닌 '힐(HEAL)조선'으로 가기 위한 출구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지난 11 월 20 일 한국선진화포럼에서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발제자인 곽금주 교수는 헬조선의 원인으로 한국사회가 지나친 비교·경쟁사회, 비정상적인 서열화 사회, 또한 심리적 절망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헬(HELL)조선을 힐(HEAL: Hope, Empathy, Allocation, Label)로 바뀌기 위해서는 보상기회의 다양화와 핸디캡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인 이창원 교수는 학생들의 절망적인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게임의 규칙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며 따라서 다수가 옳다는 것을 대변하면서도 다수의 그런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대범하게 소외되지 않게 받아주는 성숙한 사회로 공익과 법치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우연성과 자연적 우연성이 그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회적 성공과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하고자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진정한 헬조선에서 힐조선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한다.

토론자인 조준모 교수는 헬조선의 원인을 노동시장에서 차별(불공정한 임금, 승진기회 차별)로 돌리는 나와 남과의 생산성 격차는 비교하지 않고, 임금 차이만 비교하는 심리와 그것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지적하며 세대 간 문화를 고려한 인사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넓게 깔아줄 수 있고, 사각지대가 없으며 사적 가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배려들이 각각 균형이 잡힐 때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인 김수빈 지암선진화아카데미 학생은 헬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며 승자독식구조가 아닌 상생적인 자본 주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론자인 이경한 지암선진화아카데미 학생은 우리나라가 헬조선으로 불리는 이유 중 절망 사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절망 사회의 원인으로 저성장, 그릇된 언론, 전교조 세가지를 꼽았으며 이를 고쳐서 국민통합이 가능해진다면 나머지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고 헬 조선이 아닌 헤븐 조선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의 사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각자 개인이 마주치는 불합리한 상황을 표현할 때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헬조선의 완벽한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개인이 마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상황들이 오로지 물질주의와 지나친 비교등 개인에게서 기인한 것들만 존재한다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조선'의 확산에는 '사는게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감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불합리를 마주할 때 사람들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청년실업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미래보단 현실을 봐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의 경우 생활지원금으로는 충당하기 버거운 취업준비금(자격증비, 책값등)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지만 4 대보험이 적용되는 알바의 경우에 번 돈 만큼 생활지원금이 깎여서 나오기 때문에 가게주에게 자신을 종업원으로 신고하지 말아달라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일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데다가, 위험한 일이라도, 취저시급 만큼 일당을 받지 못해도 말할 데도, 들어줄 데도 없습니다.

차라리 취업이 됐다면 월급으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지만, 학업을 병행하며 하는 알바의 경우 벌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므로 4 대보험을 보장받게 되면 깎인 돈만큼 버는 수준밖에 되지 않으므로 역시 취업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미래를 제쳐두고 '현재'와 '합법'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학생이 불안함을 느끼며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100 퍼센트 노력을 안해서, 남과 비교만 해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 사이트의 데이터기반 조사 결과 '헬조선'과 가장 많이 같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노오오력'입니다. '노오오력'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채 노력만을 강조하는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취업의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과 방법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헬조선에서 탈출하려면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스펙과 탈스펙의 사이에서 과도기에 놓여 있는 현 취업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적어도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과 자격증, 토익점수가 부족한 학생들이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과 학습비를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계획서, 보고서 등을 받아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지원을 확대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성적장학금을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주지 말고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 목표를 달성한 학생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상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꿈꾸는 것을 도와줄 때 진정한 힘조선이 실현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꿈과 목표를 세우고 진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학점과 자격증, 토익이 기준이 아닌 꿈을 기준으로한 '꿈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대학교에서 취업지원실 산하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의 창업아이디어를 심사 후 지원금을 전달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소수의 기관에서 소수의 인원에 한해 진행되고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진출하고 싶은 분야 또는 우리나라 정책 개선 방안 등을 경험하기 위한 탐구계획서를 제출받고 심사 후 해외로 탐방을 보내주는 제도 또한 확대하여 누구나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꿈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현실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지원해준뒤, 목표를 세우면 그 다음 단계를 한두번 정도 더 지원해줌으로써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꿈장학금'제도가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지금 이 제도가 스펙중심이라는 취업제도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취준생인 학생들만큼은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보완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의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다시 한번 피해자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과의 지나친 비교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회적 현상을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준다면 헬조선이 완벽한 힐(HEAL)조선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⑩ 용지수(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발전을 이룩해낸 우리 경제는 현재 저성장의 굴레에 갇혀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선배 세대들이 짧은 기간 동안 최빈국에서 10 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킨 조국을 '헬' 즉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은 여러 면에서 번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20 일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98 차 월례토론회를 주제로 전문가와 대학생들의 토론회를 개최해, 요즘 젊은이들에게 닥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발제자인 곽금주 교수는 헬조선의 원인으로, 한국 사회는 지나친 비교, 경쟁, 서열 사회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다수가 절망하는 분위기를 유발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개개인이 아닌 한 사람의 가정, 가족, 배경을 지나치게 인식해 구성원을 서열화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곽금주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보상 기회의 다양화(취직시험, 재취업, 승진, 창업)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도 핸디캡을 배분함으로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계급, 직위에 따라 '권력'이 아닌 '권위'를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인 조준모 교수는 헬조선의 원인을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에서 찾는 심리에서 찾았습니다. 조 교수는 "나와 남의 '생산성 격차'는 비교하지 않고, '임금차이'만 비교하는 심리와 그것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지적하며,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시장이 되어야 공정성이 회복될 것이고, 진정한 노동개혁, 상생 나눔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구성원을 서열화시키는 태도에서 '헬조선'의 원인을 찾기도 한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창원 교수는 우리 국민들이 남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헬조선'의 원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그 사람의 정당한 노력에서 찾지 않고, 부모, 학연, 지연, 우연 등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부모의 소득, 직업, 지역 등의 사회적 우연성과 장애인, 성별과 같은 자연적 우연성이 사회적 성공과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익과 법치의 강조가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공익을 추구하는 것일 때 대한민국의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토론자인 김수빈 학생은 "헬조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개인이 물고 태어난 이 수저를 평생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내포한다는 데 있다."며 많은 젊은이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보상이 가능해지도록 분배구조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승자독식주의가 아닌 상생적 자본주의를 이루어야 하고, 과거 교육이 계층의 사다리였던 만큼 요즘 세대에도 개인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가 존재해야 하며, 실패를 받쳐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성되어야 헬조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이경한 학생은 헬조선의 원인으로 저성장, 언론, 전교조를 꼽았습니다. 이 학생은 "고도 성장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483 만 개였는데 고학력자는 428 명이었고, 현재는 양질의 일자리가 602 만 개인데 고학력자는 1050 만 명이다."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안좋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구인난을 해결해야 하며,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문제점을 침소봉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조선의 원인을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전교조라고 언급하며 이 원인을 해결하면 국민통합이 가능해지고 사회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헬조선’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갓 20 대로 들어선 싱그러운 청춘들을 서열 매기고, 지나친 경쟁의 궤도로 몰아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턴가는 ‘기업의 노예’가 되어, 학문의 전당이라기 보단 취업사관학교라는 명칭이 더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차고 넘치며 진학률 또한 80%를 오르내리지만, 그 존재 이유는 변질 되었습니다. 인문, 사회과학은 ‘경영화’ 해야 살아남습니다. 교양과목은 취업을 위한 매너로 전락했습니다. 국문과목 조차 영어로 가르칩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학점 관리와 취업을 위해, 과제부터 대외활동, 공모전, 봉사활동, 인턴십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스펙 쌓기를 해야 합니다. 학문을 탐구하지는 않지만, 부모 세대에 비해 몇 배는 비싼 등록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합니다. ‘공부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대학이 유발한 ‘헬조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대학 그 자체 뿐 아니라 기업, 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은 그 본연의 역할을 해야합니다. 우선 학생 개인의 자아와 교육적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고 ‘학문적 성취감’을 제공해야합니다. 이는 곧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하는 능력을 성장시킵니다. 본인의 인생에 대한 학생 개인의 가치 판단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획일화된 행복의 기준은 다양해질 것이며, 저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르기에 비교, 경쟁적 사회 분위기도 완화 될 것입니다.



학문적 성취감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전공'을 말 뿐이 아닌,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게 하는 교육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의 쏠림 현상을 타도하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초중고 시절부터 적성 검사, 직업 체험 등을 꾸준히 하게 해야 합니다. 학과에서는 취업을 위한 실무 교육으로의 편중을 개선하고, 기업의 신입사원이 아닌 전공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준비생 비중은 줄어들고 고학력 전문가는 늘도록,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학과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적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학문 탐구에 흥미를 느끼도록 대학 수업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은 대학 서열에 의한 고용과 임금, 승진 격차를 축소하고 채용과정을 투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서류, 면접 과정에서의 '학력 블라인드' 제도, 채용 과정에서 외국어 능력, 각종 스펙 이외의 전문지식에 대한 평가 반영도를 높이는 것, 대학교육과 연구에 대한 기업의 투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의 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 과포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중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해, 부실 대학의 증설, 장년층의 경제 부담, 학생 개인의 심리적, 물리적 불안감 등을 고취시킵니다. 정부는 '대학을 안가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구조 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학은 폐교토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학 평가를 통해 하위권에 랭크된 대학을 구조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년 실시되는 평가에서 '5 년 동안 하위 10%에 랭크되면 폐교' 하는 등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는 매우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학 평가 기준을 '취업률' 보다는 '학문 제도의 체계성',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감 정도', '학내 연구의 완성도' 등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제에 따른 대학의 역할 분리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 교육은 전문대학과 폴리텍 대학이 담당하고, 4 년제 이상은 연구목적을 가진 학생들로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중, 고등학생에게 주 1, 2 회 이상의 직업, 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전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하여, 대학에 진학할 지, 고등학교 때에 전문 교육을 받아 바로 사회 일꾼이 될 지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직업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교육과 직업 분야를 탐색하며, 원하는 직업의 핵심 역량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습관 등을 추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의 취업자격으로서의 학력을 철폐해야 합니다. 대학 이전에,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 예시로는 고졸 직원의 정규직으로 채용 권장 정책, 쿼터제 장려 정책 등이 있습니다.



대학 구조의 개선은 오래전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생 자녀가 없는 사람들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학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대학과 관련 없는 사람들'과도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교 졸업생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에서, 고등교육기관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그들 자율로만 맡겨둬서는 안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옥이라고 느끼는 것에 냉소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어른들이 해답을 주어야합니다. 캠퍼스를 컴퍼니로 만든 건 대학생 스스로가 아닌 그들을 경쟁의 굴레로 몰아넣은 이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⑪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절망적인 헬조선에 답은 있는가?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시대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취업난과 기업들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 불황을 겪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의 득세로 더더욱 국내 기업들의 성과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 내수는 침체되며 사회 갈등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헬조선'이라고 표현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이 표현이 더더욱 널리 퍼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헬조선 이외에도 n 포 세대, 수저 계급론 등이 득세하면서 더더욱 비관적인 가치관이 더더욱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을 계속해서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한국선진화포럼이 11 월 20 일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9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발제자인 곽금주 교수는 헬조선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지나친 비교경쟁사회를 지적하며 진화심리학적으로 비교를 통해 자신과 자기 집단의 사회적 위치 파악을 하는데 이것이 고착화 돼서 열등감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카드게임 실험을 인용하면서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타인의 보상과 비교하여 자신의 보상 값어치를 판단함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비정상적인 서열화 사회의 예시로 수저 계급론과 다양한 통계 지표를 들었으며 이것이 심리적으로 사회에 절망적인 인식을 팽배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헬이 힐이 될 수

있게끔 나아가야 함을 끝으로 발제를 마쳤습니다.



토론자인 조준모 교수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카스트 제도에 비유하면서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헬조선 심리를 확산시킴을 이야기 하면서 생산성 격차가 아닌 임금차이만을 비교하는 심리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제는 힐을 넘는 fair, care, share 의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이창원 교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제도의 질 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합게임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언급했으며 소수의 이익과 의견도 소외되지 않게 공익을 추구할 수 있을 때 성숙한 사회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 토론자로 나선 김수빈 학생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노력한 만큼 보상이 가도록 분배구조가 변화해야 하며, 상생적 자본주의를 이야기했다. 또한 실패를 받쳐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성되어야 헬조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경한 학생은 원인으로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 그릇된 언론,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전교조 선생들이라고 언급하며 이 원인들을 해결하면 국민통합이 가능해지고 사회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고 헬조선이 아닌 헤븐조선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의 열띤 토론으로 헬조선의 원인을 파악하고 나아가야할 방향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대안책에 대해 분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소비를 원활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소비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국내 내수는 절대 살아날 수 없고 기업 역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일부 노동자가 생산성의 격차를 무시하고 임금 차이만을 비교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생산성에 합당한 대가를 못 받습니다. 이를 정부가 개입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어 임금을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중재를 해줘야 합니다.

노동자가 좀 더 합당하고 많음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내수 시장의 소비로 이어져 기업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경제는 선순환 구조로 다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이 돌아간다면 내수와 기업이 살아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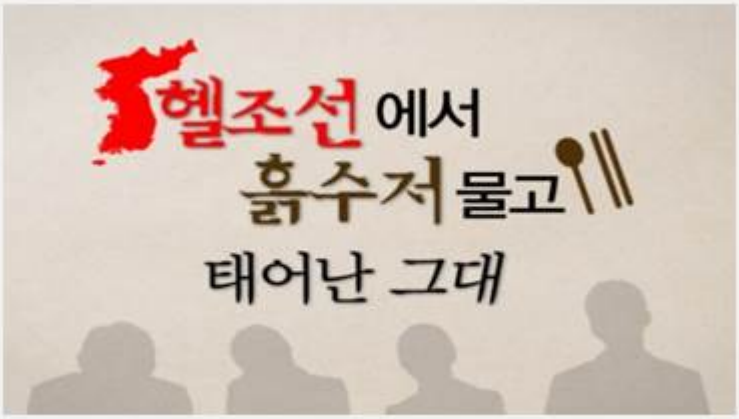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들이 얻는 일부 이익을 노동자에게 돌아가게끔 함으로써 경제가 선순환의 구조로 돌아선다면 모두가 상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이런 부분의 조정은 정부가 나서서 일부 개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계속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다면 국내 내수는 결코 살아날 수 없으며 소비가 위축되 국내의 기업들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원활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다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서 약간의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해야하는 위치에 서있습니다.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며, 인도에 치일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수가 살아나야 하며 돈이 시장에서 원활히 돌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이 때에 올바른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금의 헬조선을 벗어나 힐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⑫ 조준상(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과거에 없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에 없었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성장기에 형성된 많은 관행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다보니 사회 일각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헬, 즉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희망이 없는 사회로 비추어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제 98차 월례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지난 11 월 20 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제 98 차 월례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사회 비판적인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전문가와 대학생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자인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헬조선의 원인이 한국사회가 지나친 비교, 경쟁 사회, 비정상적인 서열화 사회, 절망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보상 기회의 다양화와 낮은 계층으로의 핸디캡의 배분을 통해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포지티브섬 게임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공익과 법치가 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 김수빈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학생은 개인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가능해지도록 분배구조가 변화해야 하며, 상생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면서, 개인의 성공을 통한 계층이동의 사다리와 더불어 실패를 받쳐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토론자 이경한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학생은 전교조 선생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통합이 가능해지고, 사회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 아닌 헤븐조선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재의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에 직접 맞닥뜨린 처지의 대학생들이 서로 헬조선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을 나눌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친 서열화와 불평등이 계층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을 해결하고, 헬조선을 탈출하기 위해 월례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은 대부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계층이동의 사다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세계 역사 상 어느 국가도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우리 모두가 동일선 상에서 출발해 '나도 잘 살아볼 수 있다'는 하나의 마음가짐으로 동기부여가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개천에서 용 났다' 식의 자수성가형 스토리는 보이지 않고, 평생 동안 주어진 계층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수저 계층론'이 우리 주위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개인이 계층 사다리 오르기의 경쟁에서 한번 밀려나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으로 차별되는 서열화와 불평등의 구조가 고착되고, 이것이 다음 세대의 계층까지 결정하는 데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한 이상 일정 수준의 불평등은 피할 수 없으며, 불평등은 사람들에게 좋은 성과를 지향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정 수준의 불평등은 사람들에게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열화와 불평등의 구조가 지나치게 심화되어, 이것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가로막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형평의 측면 뿐 아니라, 효율의 측면에서도 개인의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부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양극화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노력을 통해 다시 정규직이나 대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게 좀 더 기회를 줘 계층 이동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의 경력직 채용에 있어 중소기업 근무 경력을 적극 인정해주고, 정부가 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비정규직,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면서, 직업 이동이 자유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강대국들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의 나라에서, 현재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지 혹은 주저앉고 말 것인지 하는 경제성장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회 내에서의 지나친 서열화와 불평등 구조는 개인의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딛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개인의 성과에 대한 건전한 동기부여를 뿌리 내려야 할 것입니다.

⑬ 최민경(고려대학교 정경학부)



뜨거운 감자, '수저론' (출처: youtube)

헬조선.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쓰이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지옥을 의미하는 hell 과 조선을 합성한 신조어인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절망 섞인 감정이 표출된 대표적인 현상은 아닌가요?

한국 사회에서는 '수저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적 배경, 출신, 부모님의 재력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에 비유하여, 이것이 자신의 숙명인양 비관적인 미래에 절망하는 사태를 보여주죠. 이러한 서열화가 연예인, 재벌을 비롯한 사회적

공인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어, 개인들로 하여금 열등감과 사회 피해의식을 느끼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압축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 급격히 물질만능주의에 휩싸여 지나친 비교경쟁 사회, 서열 사회, 절망 사회라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헬조선의 구조적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헬조선, 무엇이 문제인가? (출처: youtube)

먼저,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Hell 조선을 Heal 조선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상 깊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 방안으로는 Allocation, 즉 분배 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 다 배분 보상(Reward prevalence effect)에 공감이 갔는데, 전체적인 보상에 대한 양보다, 빈도 및 횟수가 인간에게 더 심리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상대적 배분의 이론에 따라 핸디캡이 있는 약자들을 고려한 배분 체계를 강구하여, 계급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동의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한국의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와 저조한 경제 낙수효과를 헬조선의 원인으로 꼽으셨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는 경쟁과 서열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피로와 나쁜 피로가 있는데, 좋은 피로는 곧 개인을 자극하여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나쁜 피로는 미래 비관에 이은 사회 불만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나쁜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FAIR (생산성과 보상의 연계), SHARE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 CARE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젊은 층에서 집단 절망감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쉽게 남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성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꼽으셨습니다. 출신과 배경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정당한 노력조차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적당한 경쟁도 불공정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즉, '게임의 규칙'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론자로 함께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수빈 학생은 이에 덧붙여 현재 젊은 층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수저'가 영구적이고, 바뀔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체계와 상생적 자본주의, 그리고 실패를 받쳐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이경한 학생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기업,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해결할뿐더러, 경제적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뿐더러, 한국의 편파적 언론을 비판하면서, 맹목적으로 자신의 관점에 따라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의 등장은 단순 젊은 층들의 불평과 어리광으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시위로 여기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헬조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필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째는 지나친 가족중심주의의 사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헬조선과 더불어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수저론'입니다. 그리고 이 '수저론'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신과 가정적 배경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개인의 노력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 노력의 힘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에서 젊은 층들이 더 불공정함을 느끼는 듯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들과 정치인들 등 사회적 권위를 가진, 흔히 '금수저' 부모들이 솔선수범하여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먼저,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서야 합니다. 승진, 직책 등이 혈연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을 없애도록 능력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개개인들의 자발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정책 차원에서도 감시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 빨리 국가가 젊은 층들의 신뢰를 얻고, 우리 사회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어 N 포 세대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의 기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상대적으로 계산하려는 성향이 강해, 남과 나의 행복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엄격한 국민들, 특히 젊은 층들을 잘

회유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앞서 곽금주 교수님의 말씀처럼 빈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숨만 쉬고 10 년 동안 일하고 겨우겨우 승진하는 그런 보상이 아닌, 학교에서의 '향상상, 진보상'과 같은 자극제가 필요합니다.

성과급에 대해 언급될 때 늘 등장하는 대표적 사례인 미국의 통신 기업 GTE 는 인센티브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경쟁을 기초로 하는 인사고과 계획에 따라,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는 변동 급여 체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평등성, 기술력, 공헌도, 전문성에 따라 7 등급으로 평가되고, 각각의 성과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개인 성과급 체제로 월, 분기, 연도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GTE 가 고성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훌륭한 인센티브 제도를 갖춘 기업의 사례로 소개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지나친 가족중심주의 보다는 능력을 인정해주고, 젊은 층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면 우리 사회가 선진화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⑭ 최현수(홍익대학교 예술학과)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1 월 20 일 명동은행회관빌딩 2 층 국제회의실에서는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한국 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토론회에서는 최근 타인들과 지신을 비교하려는 심리로,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면서 헬조선, 수저 계급론 등의 용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하여 고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배분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적 배분과 다배분 보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헬조선에서 힐조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하며, 공익과 법치를 강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진정한 CSR 을 통하여 상생을 이루어 나아가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모든 사람들은 타인과 비교하는 심리가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압축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수빈 학생은 승자독식주의가 아닌 상생적 자본주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개인의 성공을 위한 사다리와 실채를 받쳐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이경한 학생은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언론의 정상화가 헬조선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힐조선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저 계급론과 같은 회의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헬조선, 수저 계급론 등 사회 냉소적인 언어와 표현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곽금주 교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사회의 지나친 비교 경쟁사회, 비정상적인 서열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다양한 체험과 꿈의 탐구 기간을 겪지 못하고, 모두 입시 위주의 교육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나친 경쟁의식 속에서 살게 되고, 계속해서 남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청소년 교육 문제가 우리나라 계속된 경쟁사회, 비교, 서열화 사회가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부터 창의적이고 실천적 교육을 통하여 다른 친구들이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함께 나아가고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동지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천적 교육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사회 기반에 대한 암기와 지엽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초점을 입시가 아닌 자아의 실현과 가치의 추구에 둔다면, 현재 상황에 만연해 있는 경쟁의식과 비교 의식을 중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강국 스웨덴의 예를 들자면, 스웨덴은 실용주의 교육과 창의적 교육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실천하고 경험해보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1 + ( ) = 2 와 같은 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 ) + ( ) = 2 와 같은 서로 다른 답을 낼 수도 있는 식의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니라의 교육이 유치원, 초등학교 에서는 인성과 예의 위주의 교육이 중요하고, 중고등학교 때에는 개인들의 꿈을 위한 진로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소방서, 경찰서, 공무원 혹은 개인 사업자들을 명예교사로 초빙하고 제휴함으로써 후에 이 사회에 어떤 측면으로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을 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학만을 위한 통로가 아닌, 그 시절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목표를 찾는 기관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위주의 수업 이외에도 야외, 다른 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기관들과 협업하고 체험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비교와 경쟁 보다는 자신의 역할을 찾는 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문제에 있어서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왜 가야 하는지, 직접적 체험을 통하여 진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위하여 정부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와 제휴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체험 위주의 교육과 실천적인 진로교육을 통하여 진정한 교육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헬조선, 수저계급론 코드 같은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더이상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이 아니라, 발전적이고 조화로운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⑮ 김다혜(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등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제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 갈등, 고령화 사회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혐오”가 난무하고 특히 젊은이들의 정서가 불안한 시점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요즘 유행처럼 떠도는 “헬조선”이나 “수저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반감으로 표현되고 또한 바이러스와 같이 전파되어 “증후군”을 만들어 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성장 시대에 취업문이 좁아지고 경쟁은 더 과열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즉 청년들의 불안한 심리 때문입니다.



초등학교학교 부터 대학까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윤리성의 부재

특히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과잉 경쟁과 물질 만능의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타인과 비교하는 심리를 갖게 되고 이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상대적인 열등감, 박탈감, 빈곤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발전하고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게 확산되기도 합니다.

어떤 집단이 무엇을 공평하다고 간주하는가는 그들의 역사, 제도와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고 조직의 윤리적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경쟁에만 집중하다 보니 학교에서의 윤리 교육이 부족하고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정치가이자 사상가, 교육가였던 공자는 백성을 중시하고 인간의 심미적 부분을 존중하라고 하였습니다. “仁”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착한 마음으로 “道”와 “德”을 겸비하여 인간에게서 기대되는 개개인의 훌륭한 자질이고 인격적으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제나라의 경공이 어떻게 하면 암울한 시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君君臣臣父父子子”즉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며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의미로 저마다 각자 맡은 바대로 움직이면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 기강이 잡힌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비 도덕성

공자의 말씀을 빌려 오늘 우리사회의 만연하는 혼란스런 현상에 대입시켜 본다면 지식인은 지식인답게, 부자는 부자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솔선수범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요즘 청년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정치인들과 언론의 비도덕적인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절망에 빠져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특히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성취감을 안겨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노력해도 안돼.’가 아니라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정신 문화를 배워 윤리성을 찾는 노력

또한 상대적 비교문화를 배제하는 사회적인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신적 문화자산인 “홍익인간”정신을 구현하는 사회적인 열풍이 필요합니다. 돈이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仁義禮道”를 배워 윤리적인 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개발도상국 등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대학 시절은 청년들에게 가장 값진 시절입니다. 이 시기에 발전도상 국가들에 가서 인턴, 봉사,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넓은 안목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앉아서 ‘수저론’이나 ‘지옥’이라 한탄하고 비관하는 것보다, 서로가 방법을 모색하여 “Hell”에서 “Heal”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가장 빠른 시기에 발전 했고, 어려웠던 IMF 시기도 온 국민이 함께 이겨낸 지혜로운 국민입니다. 이런 정신을 이어 받아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지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계산(전경련 포럼)

⑯ 김수빈(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헬조선'이라는 표현은 청년들의 좌절을 나타냅니다

최근 온라인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옥을 뜻하는 'Hell'과 조선이 합쳐진 단어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옥처럼 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많은 경세성장을 이루었고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데, 왜 젊은이들은 지옥만큼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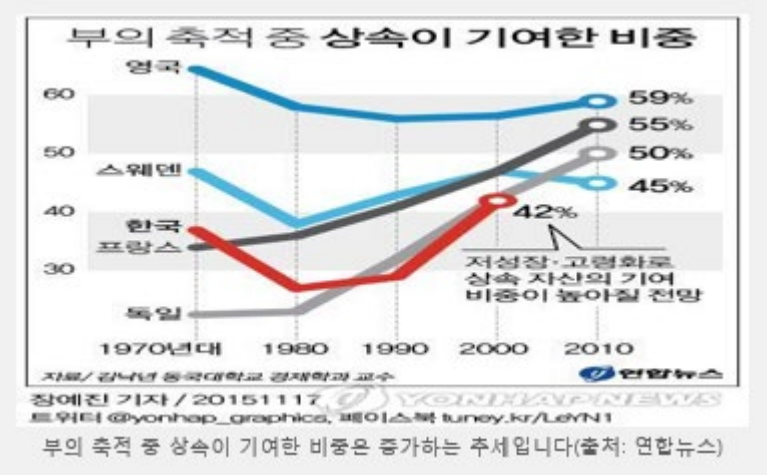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사용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금수저', '흙수저' 등 부모님의 재력에 따라 개인의 신분이 나뉜다는 소위 '수저 계급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금수저'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단순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칭하는 표현으로만 사용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은수저, 흙수저부터 시작해서 다이아몬드 수저 등 '수저'들은 세부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2 위입니다. 근로시간 자체도 많을뿐더러 야근 등으로 인해 가정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을 피해 청년들은 더욱 더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을 선호하게 되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헬조선'과 '수저'라는 두 가지 표현을 단순히 유행어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성장과 실업, 과도한 업무로 '3 포', '5 포'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합니다. 첫째로, 젊은이들의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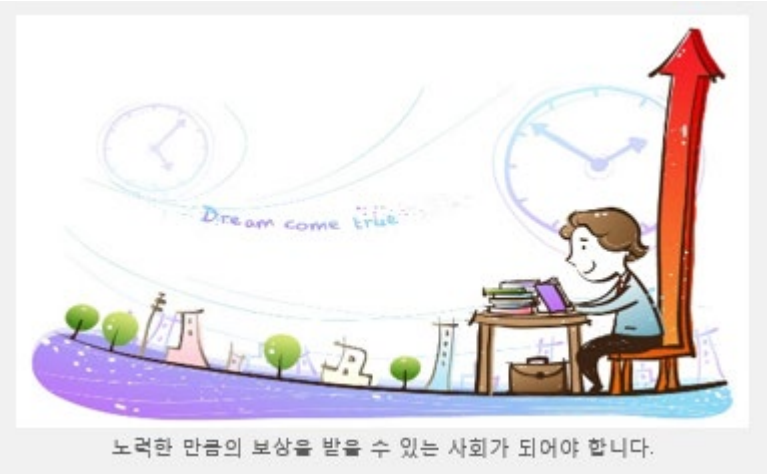
부의 축적 중 상속이 기여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출처: 연합뉴스)

'수저론'의 핵심은 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수저를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김낙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소득의 기준에 상속이 차지하는 기준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는 조만간 주요 서양 국가들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 열풍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날수록 좋은 교육을 받고, 취업시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흙수저'들의 좌절을 불러올 것입니다. 교육 기회의 확대는 물론이고, 공정한 기회의 제공을 통해 수저 때문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무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높은 반면 업무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성과 중심이 아닌 근속연수만으로 연봉을 계산하는 호봉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야근과 과도한 업무를 줄이되, 근로 시간 내에 최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당연히 보장된 권리를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어야 '3 포 세대'는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내가 태어난 환경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은 이제 단순히 온라인 유행어가 아닌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누구보다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어야 합니다.

⑰ 류호영(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인기 게임 LOL에 열광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게임 좋아하시나요? 2015 년 현재 한국 PC 방에서 4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롤(League of Legends)'이라는 세계적인 게임입니다. 네트워크상에서 펼쳐지는 롤 대회(league)는 축구 경기 시청만큼이나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게임 종주국 혹은 게임 강대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인들이 게임에 대한 열정과 실력이 뛰어나,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재)한국선진화포럼 제 98 차 월례토론회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에 참여했을 때, 이창원 교수님(한성대학교 행정학과)의 토론을 듣고 “대한민국의 롤의 인기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 느끼는 이유: 불공정성 인식

이창원 교수님께서는 현실에서의 게임은 성장 동기를 자극하여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성장을 일궈낸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불평등이 고착화되면, '게임의 규칙'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즉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저론과 헬조선론은 '게임의 규칙'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입니다. 게임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 게임 참여자들의 의욕은 확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는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게임의 규칙이 불공정하면 게임은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절망한 구성원들이 착취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라 인식하게 되면 활동이나 참여를 중지하게 되고, 결국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건전한 경쟁은 사라집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절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다르게 시작부터 공평한 GAME

왜 수많은 게임들 중에서도 특히 롤에 열광할까요? 한국에 출시한 지 4 년이나 지났음에도, 그 열광은 왜 이렇게 오래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유가 짐작 가시나요? 수많은 종류의 게임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게임 '롤'은 여러 명의 게임 참가자들이 각자 선택한 아바타를 전략적으로 움직여 승리를 이끌어내는 게임입니다. 게임 속 아바타인 '챔피언'이 가진 '능력'은 제각기 다르지만, '맡은 역할(position)'에 따라 전략을 펼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는 팀원들과의 실시간 협동 플레이도 중요한 승리요인이지요.

어쨌든 간에 각 챔피언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기술)은 서로 다르지만, 상당히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결국엔 맡은 역할에서 '더 조종을 잘하고 더 전략을 잘 구사한 플레이어'가 이기게 됩니다. 한 마디로 챔피언 자체의 능력보다는 플레이어의 "실력"이 승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실력"으로 승리를 결정하는 공평한 게임 방식을 가진 롤은 오랜 기간 동안 부동의 1 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초기에 인기를 끌던 롤플레잉 게임(RPG)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게임을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일찍이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을 도저히 따라잡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간에 자족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자, 그럼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열광하는 '롤'이라는 게임의 규칙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대한민국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사회 구조를 비난하고 있을까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편하거나 망한다는 생각이 헬조선과 수저계급론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엉망진창으로 엉켜버린 게임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사회' 구현이 가장 요구됩니다. 공정한 사회란, 능력·역량이 유사한 사람들은 성공가능성도 유사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간에,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지식·능력이 대우 받는 사회입니다. 지금보다 더 '노력'이 대우 받는 공정한 사회,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기업이 먼저 인재를 찾아 나서게 만드는 [능력 포트폴리오]

저는 [능력 포트폴리오] 제도라는 정책제안을 합니다. 미술,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은 취업을 할 때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문/상경/공학 등 모든 계열들도 취업을 위한 능력 포트폴리오를 게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능력 포트폴리오는 최대한 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태어나고 자란 과정,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 좋아하거나 질색하는 학문, 아르바이트나 대외활동 경험, 일하고 싶은 분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 이것저것 진솔하게 글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이트 내 상담센터를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첨삭 받고, 부족한 능력은 무엇이며 끄집어내야할 잠재력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로지 기업 인사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에 대해 조언 코멘트를 달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능력 포트폴리오를 상시 게시해놓으면, 인사담당자들이 헤드헌팅해가도록 유도합니다. 기존에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마다 다른 수십개의 입사지원서를 힘들게 작성하여 이곳저곳 넣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입사지원서인 능력 포트폴리오만 올려놓도록 합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인력이 부족할 때마다 수시로 능력 포트폴리오를 보고 상시 채용하는 식으로 간다면, 매번 공채를 할 때마다 드는 비용 또한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게임 '롤'처럼 내가 가진 능력에 맞는 적절한 역할(position)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맡은 역할에 충실하여 "실력"을 발휘하고 동료들과 잘 협동한 끝에 성취해낸다면, 어느새 나도 브론즈에서 실버로, 실버에서 골드로, 골드에서 다이아몬드 1 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나가는 와중에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게임에서도, 전장에서 치고 박고, 열 받아하다 기뻐하고 다시 짜증내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꾹 참고 실력을 키우다보면 어느새 우리에겐 승리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⑱ 윤수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근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이 사회구성원 간에 팽배하다.

최근 헬(hell)조선,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들불처럼 유행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이 비일비재하고 소위 ‘노오력’을 해도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 나기’가 어려운 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리서치기관 엠브레인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한 설문에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어서’ 라는 답변이 1 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지가 않아서’, ‘빈부격차가 심해서’, ‘경쟁이 심해서’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눈부실 정도로 빠른 고도의 압축 경제성장과 견고한 민주사회 구축을 동시에 이룩한 유례없는 나라로 해외 선진국 사이에서도 주목 받았던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런 희망이 없는 사회, 공평성이 결여된

사회, 빈부격차와 경쟁만이 심화된 ‘절망사회’로 변모한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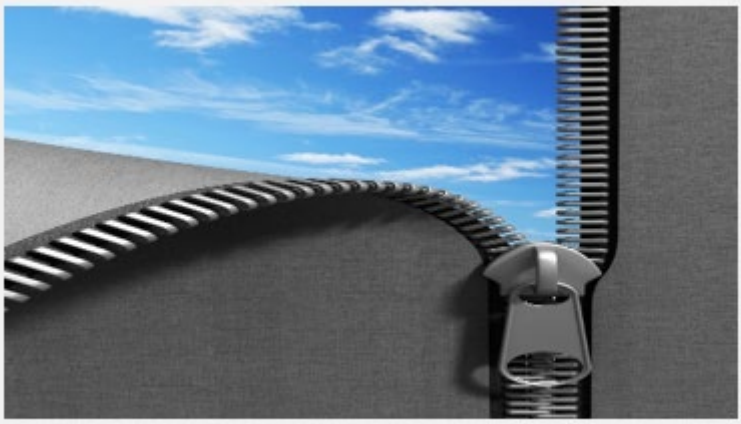
사회 공평성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절망사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법치와 공익의 강조가 오히려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공고하게 할 뿐, 대한민국 분배정의가 전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불신이 사회 전반에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력해도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학습된 무력감'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 발전가능성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N 포세대'라고 지칭하며 노력할 의지마저 상실해 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그런 무력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경쟁환경과 환율전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저성장 기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심화가 대한민국 미래발전에 있어 위기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무력감은 대한민국 발전동력을 저해하는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기력한 헬조선 상태를 벗어나 보다 발전지향적이고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정한 보상체계의 확립을 통해 분배정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우선 첫째로,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과 절망감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법으로써 ‘분배 정의와 공평성 결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합니다.

담합적 노사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와 근무환경 양극화, 저조한 낙수효과 등 대한민국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지 않고, 착취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믿게 만드는 사회구조적 모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불공정한 임금과 승진기회차별 등이 난무하는 것이 아닌, 생산성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확립해야겠지요. 특히 공정한 보상체계를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회'라는 신뢰감을 사회구성원 간에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회구성원 개개인들 또한 무조건적인 비교를 통해 스스로의 능력부족은 생각지 않고 '남탓', '사회탓'만 하는 태도를 걷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흙수저 계급론'과 같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의 위치를 절망적인 상태로 고정하고 노력 자체를 체념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저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해버리기 보단, 경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이 원하는 공정한 사회보상체계와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발전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곧 그 사회의 모습을 결정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미래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곧 그 사회가 실제 나아가는 방향으로 구현되기 마련입니다. 절망과 체념,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불신으로 갈등비용까지 자아내고 있는 '헬조선'에 대한 자조섞인 인식이 과연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을까요?

1960 년대는 "우리도 잘 살아보세"라는 노랫말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노력하면 빈곤을 벗어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⑲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요즘 20대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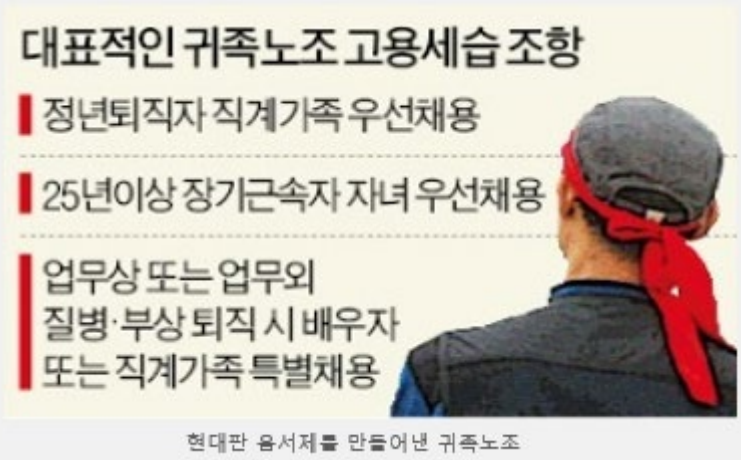
요즘 20 대들은 인터넷은 물론 일상에서도 헬조선, 금수저, 은수저 등의 표현을 자주 씁니다. 헬조선은 지옥같은 우리나라를 의미하고 금수저와 은수저는 자신의 출신배경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20 대들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20 대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회가 점점 닫힌 사회, 즉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의해 부유한 집안의 자손들은 계속 부유한 삶을 살고 가난한 집안의 자손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20 대들은 희망을 잃고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흙수저 계급이라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어서 20 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에서 더 적극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데 이 교육을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가고 문제집을 못사고 일을 합니다.

반면에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은 한 달에 백만원이 넘는 과외를 받고 수많은 문제집을 풉니다.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 너무 뻔하지 않나요?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하고 교재비를 지원하는 등의 선별적 복지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어낸 귀족노조

다음으로 음서제를 없애야 합니다. 최고 수준의 복지, 봉급, 업무환경을 가진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조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자신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입사가산점, 특별채용 등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들은 현대판 음서제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부모를 두지 않은 일반 20 대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끊임없이 스펙을 쌓아도 취업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부모 잘만난 20 대들은 음서제를 통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최고의 직장에 들어갑니다. 수저계급론이 나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고시를 존치하고 행정고시의 공채를 확대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는 계층이동의 사다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도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합격함으로써 성공하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는 곧 폐지될 예정이고 행정고시 공채는 계속 축소되는 중입니다. 대신에 부유한 집안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학비가 필요한 로스쿨이 확대되고 수많은 스펙과 화려한 경력이 필요한 행정고시 특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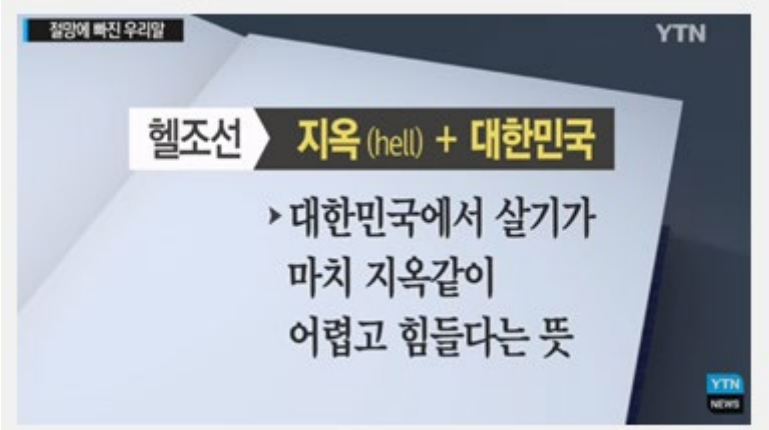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없애서는 안 된다

계층이동의 사다리인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공채를 없애거나 축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다리들이 있어야 20 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20 대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사회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20 대가 특혜를 보고 모든 기회를 독차지하는 이러한 현실을 모든 20 대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쳐야 합니다. 20 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⑳ 정복윤(고려대학교 경제학부)



점차 SNS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헬조선' 용어

대한민국은 고성장시대의 화려했던 이전경제와는 달리 지금은 저성장으로 경제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속에서 취업난이 형성되고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을 지옥에 빗댄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헬조선' 표현은 언론과 SNS 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청년세대들에게 불안감과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등의 수저계급론까지 나타나며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기 몹시 어려운 세상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젊은이들은 '헬조선'과 '수저계급론' 등의 단어를 장난스럽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부가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명 우리사회는 진지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위 단어들은 사회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닌 대다수가 이 단어를 알고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헬조선'과 '수저계급론'을 통해서 청년들이 한국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필자는 두 가지가 한국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헬조선은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문을 뚫을 수 없는 청년들의 비애가 담겨있습니다. 수저계급론은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결국 편하게

성공하고 집이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봤자 현실에 부딪혀 꿈을 이루지 못하는 절망감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해도 슬픔과 좌절이 계속되어 그 청년들이 '학습된 무기력함'을 체득한다면 그곳이 정말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 때는 노력마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구성원이 노력하지 않는 사회는 경쟁이 불가능하고 발전이 불가능한 진정한 암흑사회입니다.

또한 노력한 만큼, 경쟁에서 승리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경쟁에서 승리해도 기회를 주지 않고, 가정배경 때문에 대가를 받을 수 없다면 자본주의의 지속이 어려워지며 사회구성원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노력한 만큼, 경쟁에서 승리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는 기본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한국사회라면 저희는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에게 노력하라는 말조차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대로 된 룰이 적용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규칙'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청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두에게 동등한 출발선, 두 번째로는 공정한 규칙입니다.



사람들이 경쟁하기 이전에 비슷한 출발선에 있어야 합니다. 기회의 평등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받을 수 없다면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노력했는데 가정배경이 좋은 아이가 더 높게 평가받는다면 결코 경쟁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 두 가지 규칙이 시장경제체제에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도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즉, 시장에서의 정부역할을 정부가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금수저는 노력안해도 성공하고 벌을 받아도 형량이 가볍다면 누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을까요? 따라서 정부가 제도적인 틀을 잘 마련하여 제대로 된 '사회의 룰'이 지켜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헬조선'이나 '수저계급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웃어넘기거나 사회가 심각하구나 정도의

생각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사회적인 문제제기라고 여기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림 1) https://www.youtube.com/watch?v=EQng7KEaGp4

㉑ 정우재(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성장과 청년 일자리 부족, 수많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기 힘든 현실, 취업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계급 등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마치 지옥과 같다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21 세기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 세계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200 년 전에 태어났다면 봉건적 신분 사회에서, 100 년 전에 태어났다면 식민지 시대에서, 50 년 전에 태어났다면 전쟁 후 보릿고개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느리지만 조금씩 진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전성기의 한국을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이 사회를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급격한 압축 성장으로 인해 정신적 성숙이 물질적 성장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100 년, 200 년에 걸쳐 성숙한 영국, 미국과 달리 한국은 50 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든 빨리 빨리 하는 문화, 성과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이는 지나친 경쟁을 초래했습니다.

그 밖에도 저성장과 청년 일자리 부족,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 심화, 열악한 본인과 잘난 타인을 비교하면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열심히 노력해도 계급은 바뀔 수 없다는 비관적인 인식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선동에서 비롯된 저신뢰 분열사회의 모습

저는 그 중에서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언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언론은 사회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건전한 비판을 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합니다. 기자의 사명감은 투철해야 하며 직업윤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자의 펜대는 비판 가운데서도 신중해야 하며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언론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서서 일조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좌절에 기름을 붓고만 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인식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목소리 내기에만 급급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를 접하는 국민들은 자연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고 현실을 사실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부는 언론이 퍼나르는 괴담에 선동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이러한 식의 보도는 큰 문제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괴담과 광우병 파동, 촛불 시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기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펜대를 잡지 않는 기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만의 깊은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인 이슈거리를 만들어낼까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해야 하나 일부 기자들은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하며 문제점만 지적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그들의 행태가 불평 사회, 불만 사회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릇된 언론은 헬조선을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며 사회와 국민들을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언론만 그 원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론이 괜찮은,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모습까지 헬조선으로 인도하는 중심에 서서 확성기를 틀어넣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헬조선 문제의 절반은 언론의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확성기가 되어야 하나' 스스로 고민하는 언론의 자세가 필요하다

언론 개혁이 시급한 때입니다. 언론은 불평과 불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펜대를 쥐고 글을 쓰는 기자는 영악한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직 사실에 근거한 기사만을 써야 하고 그 글은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자들의 직업관과 사명감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언론사들은 똑똑하고 글 잘쓰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사고하며 확고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을 기자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특종만을 노리는 태도나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보도를 일삼는 언론은 법을 도입해서라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언론은, 그리고 기자들은 스스로 어떤 확성기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것입니다. 언론의 개혁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헬조선을 벗어나는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든 상황임은 분명합니다만 얼마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시 기꺼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젊은 세대들의 움직임은 충분히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한 희망적인 인식과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권새암 (서울대 경제 1) : 안녕하십니까,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국의 상황이 힘들다고 느낀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말로, 한국 사회의 미래가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기에, 한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해결해나가서, 헬조선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실업난 및 상대적 빈곤 문제입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어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것이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부족, 실업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일자리 부족 해결 방안으로 노동 공급 불균형 조정 및 인력 수급 해결이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에, 이공계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인문사회를 전공한 사람이 훨씬 많아서, 회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구직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노동공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수급 대책'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을 (서울대 경제 2) : 2021 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문이과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대학교 인원을 조정하여, 이공계 쪽에 더 많은 인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이공계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고, 문과는 적절히 줄여야 합니다.

당장 급격하게 바꾸는 것도 아니고, 5 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대학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공계 인재가 더 많이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승모 (서울대 수의예 1)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낸 과학기술인재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이 이공계의 과목인 수학, 과학에 흥미를 잃는 이유는 중고등학교에서 너무 이론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생활 연계형 수학과학 교육과 이공계 진로 교육도 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문이과 구분을 폐지할 계획이고, 교육 과정을 개편하여 교육 내용도 개선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중점 학교를 더 확대하고, 과학과 기술가정 내용을 잘 연결시켜,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 파트도 중고등학교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과학 실험은 학생들에게 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실험 재료와 기구 지원을 늘린다면 과학기술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공계 대학생 멘토링, 과학관 체험 등 이공계 진로 탐색도 연결된다면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 이공계 인력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홍 (서울대 화생공 2) : 이공계 인재 육성에는 전문 기술력을 가진 인재가 필수적입니다. 일단 현재 각 기업에서는 많은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깊은 과학 전공 지식을 가진 그런 인력이 아니라, 특정 기계, 전기, 전자 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룰 인재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이스터고라든가, 전문학교 등에서 전문 기술을 배운 기능사, 기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직이 분명 필수적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 인력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만연합니다. 최근에 취업난 때문에 이런 시각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재빨리 바꾸어줄 계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마이스터고, 전문기술학교를 좀 더 확대, 사람들을 끌어 모아, 기술 인력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이런 교육 체계를 잘 갖추어 놓으면 미래의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금태을 (서울대 경제 2) :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한국의 저성장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 만큼, 단기간 내에 노동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저성장 해결에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준생들, 인문사회 전공자들에게 이공계 복수전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전공자들만 수강할 수 있는 이공계 수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거나, 기술 교육 기관·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인문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인 삼성의 SCSC(Samsung Convergence Software Course)처럼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직접 전문기술기관, 학교 등을 설립하여 인문사회계 인력들을 이공계 인력으로 전환시켜보려는 노력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요지는, 현재 취업 시장에 나와 있는, 혹은 머지않아 나오게 될 20 대에게도 많은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새암 (서울대 경제 1) :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에 부족한 이공계 인력 확충을 위해서, 대학교 인문사회계 정원 조정, 중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 개편, 전문기술학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기술교육 등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의 취업난은 앞서 말했듯이, 노동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발생하는 요인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면 정부는 사람들의 이공계 능력 배양을 촉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느 정도 노동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난이라는 큰 장애물을 넘으면, 헬조선이라는 오명을 벗는 날도 머지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나종문(고려대 미디어 2)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선진화 연구모임에 이어 오늘도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기 힘든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지금도 힘들지만 미래에도 나아질 방법이 없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서,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부족, 실업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현재 고용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방안은 고용 시장을 해외로 열어,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이 인재들을 데려가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면 취업과 인재에 대한 대우까지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희원(미디어 2) :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에, 이공계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상대적으로 문과 계열을 공부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공계열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필요한 이공계열 분야에는 인재난을 겪고 있는 반면, 문과 계열 분야에서는 인재가 너무 많아서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해야 청년 실업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인원을 조정하여, 이공계 쪽에 더 많은 인원을 배분하고 문과 쪽에는 인원을 줄이는 등의 인원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세라 (미디어 3) : 박희원 학우의 의견에 덧붙여서, 저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인원수 조절을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과, 이공계 계열은 고등학교 때부터 갈라지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문과 계통의 경쟁률만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때부터 이공계 계열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가 취업이 더 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과 계열을 선택하는 이유는 보통 이공계쪽에서 가르치는 과학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론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교육 과정을 개편하여 이공계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실생활에서의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윤 (미디어 2) : 저는 스펙 중심의 고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문과 계열은 필요한 인원에 비해 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스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이런 스펙들 중에 실제 업무에서 도움이 되는 스펙은 몇 가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스펙까지 쌓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쟁자들보다 무엇이라도 더 해야 한다는 뜻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저는 실제 업무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스펙 때문에 불필요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는 스펙을 실제 업무와 관계가 있는 것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공계 계열의 회사라면, 문과 학생이더라도 쓸모없는 동아리 활동 경력이나, 영어 점수보다는 과학 계통의 자격증과 같은 스펙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스펙들을 제시해준다면, 청년들이 불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품은 늘려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늘려야 합니다.

손연준(미디어 2) : 민경윤 학우의 의견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조금 덧붙이자면 결국 현재 문과 계통 인재들이 모두 취업할 수 있게끔, 일자리 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스펙 경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공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지금 당장의 헬조선 풍조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취업에 실패해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는 이상 헬조선 풍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저는 우선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치고 야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야근을 해야 한다는 말은, 현재 기업의 인재들이 제 시간에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인재들이 제 시간에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교 (미디어 2) : 손연준 학우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기업들이 일자리 개수를 줄인 계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면서, 기업이 경영사정이 나빠지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개수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일자리 개수가 늘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일자리 풀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자리 풀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기업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하기 좋지 않은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리콘 밸리처럼 아이디어와 사람만 보고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펀딩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에서도 경영 수업을 진행하여 창업을 해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종문 (미디어 2)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자리 풀을 늘리기 위해서 해외 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윤아 (미디어 3) : 나종문 학우의 의견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자리 풀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의 일자리로 눈을 넓힌다면, 취업을 하지 못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에 관련해서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회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내 기업에 국한되어 있고, 해외 기업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일부 지사들 정도밖에 없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회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의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자체적인 교육이 있어야 하지만, 해외 기업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실업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건 (미디어 2) : 김윤아 학우의 의견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아무리 교육과 같은 방법으로 해외 기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해외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 능력이나 업무 능력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받쳐줘도 해외 문화 그 자체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취업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어에 대한 공부는 많지만, 외국 문화 그 자체를 이해하려는 공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윤아 학우가 말했던 일자리 교육 시스템에 외국 문화를 체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환 (미디어 2) : 단순히 외국어나 외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도 우리나라 인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 기업이 인재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에는 우리나라 인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정부에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서, 인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면 인재들이 해외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준호 (미디어 2) : 저는 지금의 토론 방향과는 조금은 어긋나지만, 헬조선 풍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 문제만이 아니라, 취업한 이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노력 끝에 취업에 성공했지만, 취업을 한 이후에는 끊임없는 야근 등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기 힘듭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국가 2 위에 선정되어 있는데요.

매번 제대로 된 여가시간 없이, 야근과 주말근무까지 하는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한 이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살기 힘든 국가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게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많은 기업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보장하고 대신 일의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정된 시간 내에서 효율성 높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머지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가질 수 있게끔 한다면, 직장인에게서 헬조선 풍조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동현 (미디어 3) : 저는 취업 이후의 복리후생도 좋지만, 정년퇴직할 수 있게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들어가면 40 이전에 해고당할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 보통인데요.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사람들은 대우가 낮더라도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취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장 복리후생을 잘 챙겨주는 회사라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면 부담이 가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년을 보장하여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이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인재는 많고,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인건비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정년 이전에 퇴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까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정년 이전에는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경력직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만 갖춘다면, 정년까지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부담감을 많이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진행된다면 언젠가는 헬조선 풍조가 사라질 것입니다.

나종문 (미디어 2) : 정말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에 고용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한 이공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창업과 해외기업 취직을 통해서 일자리 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 취업 이후에도 복리후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현재의 헬조선 풍조는 실업과 취업 이후의 복리후생 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조선 풍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 Hell 조선의 풍조를 씻어내고 Heal 조선 풍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참여해주신 학우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경 (정경 1):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학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 제 98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인 '헬조선' 신조어와 수저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러한 사회 풍자적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헬조선은 지옥을 의미하는 헬과 우리사회 조선의 합성어로 우리나라 사회가 현재 청년실업, 경제침체,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반영된 용어죠. 이에 대해 월례토론회에서는 교수님들과 대학생들이 인간의 비교심리와 대물림에 따른 피해의식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셨고, 해결책으로는 다 분배 보상 도입, 기업의 분절적 노동 구조와 저조한 낙수 효과 해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특히 지나친 가족중심주의의 사회로부터 벗어나고, 하루 빨리 국가가 젊은 층들의 신뢰를 얻고, 우리 사회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어 N 포 세대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족중심주의 탈피와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필자는 지나친 가족중심주의가 현재 가정배경과 출신에 따라 미래를 단정 짓는 '수저론'을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들과 정치인들 등 사회적 권위를 가진, 흔히 '금수저' 부모들이 솔선수범하여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서야 합니다. 승진, 직책 등이 혈연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을 없애도록 능력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개개인들의 자발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정책 차원에서도 감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 사회 불공정에 가장 큰 반감을 갖고 있는 젊은 층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빈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향상 상, 진보 상'과 같은 자극제가 필요한데, 한 예로 미국의 통신 기업 GTE 는 인센티브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경쟁을 기초로 하는 인사고과 계획에 따라,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는 변동 급여 체제를 수립하여, 직원들이 평등성, 기술력, 공헌도, 전문성에 따라 7 등급으로 평가되고, 각각의 성과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가족중심 주의를 탈피해야

양정윤 (정경 1): 공감합니다. 특히, 가족중심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혈연관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수저론'이 생겨 헬조선이란 표현이 더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신의 능력으로 정당하게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수저론을 내세우며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을 간과하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족 중심주의는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주원 (정경 1):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이지만, 인센티브 제도는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 지나친 경쟁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더 능력제로 사람들 평가하려는 제도들을 도입한다면, 젊은 층들이 더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게다가, 그 인센티브 제도가 과연 공정하게, 출신과 배경을 보지 않고 능력으로 직원을 평가하는 정당한 결과를 보일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보상체계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흙수저'들과 같은 계층에 대한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연 (정경 1): 공감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청년들이 창업 실패를 할 경우 크게 5 억까지 갚아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대학교 졸업을 하면 나라에서 3 년 동안 실업자 수당 80 만원을 제공하고,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고작 30 만원입니다. 다 사회에서 복지 차원으로 제도화시켜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다면, 과연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쓰일까요?

채연정 (정경 1): 저는 아예 색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SNS 이용 실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게시되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 본인이 금수저임을 자랑, 과시하거나 행복감에 젖은 일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더 쉽게 열등감과 격차, 사회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SNS 이용 실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경 (정경 1): 가족중심주의 탈피와 보상체계 강화에 대해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 밖의 새로운 의견들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여주원, 박승연 학우께서는 새로이 인센티브제도와 더불어 복지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흙수저가 느낄 사회 불만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채연정 학우는 현재 SNS 이용실태가 개선되어 사회 계층들 간의 격차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어야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참여해주신 학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강유정 (이화여대 교육 2) :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청년실업과 지속적인 저성장을 배경으로 헬조선, 수저계급론, 지옥불반도 등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점점 고도화되는 서열사회와 절망사회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청년사회를 넘어 학교 현장에까지 만연해진, 서열화된 교육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열사회는 이미 교육현장에도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교과학습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점수에 따라 학생들을 수준별로 분류하며 지나치게 수월성을 강조하는 학교의 풍토는 결코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없습니다. 등급이 매겨져 수준별로 차별화된 수업을 받는 방식은 수준별 학습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제공합니다.

수준별 학습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킨다면,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서열구조가 이미 교육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수월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교육 현장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연 (이화여대 교육 2) : 동의합니다. 저는 서열화된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해 먼저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잘 알려진 평가방법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서열을 매길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먼저 절대평가는 일정한 준거를 넘으면 점수를 얻게 되는 방식으로 다른 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서열이 부과되는 상대평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준거설정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수적이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또한 성장기반평가가 있는데, 이는 현재 자신의 성적이 과거 자신의 성적보다 얼마나 성장하였는지에 주목하는 평가방식입니다. 이처럼 서열을 매기는 상대평가 외의 다른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와 도입이 필요합니다.

황지회 (이화여대 교육 2) : 저는 교사의 가치관이나 행동이 학급의 분위기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예시로 들자면,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나 교과과목 선생님께서 시험 성적으로 등수를 매겨 학급학생들에게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데, 사실은 학생들 사이에 서열을 조장하는 잘못된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학급에서 성적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목에 경중을 두지 않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만을 주요 교과목으로 여기고 그밖에 다른 과목들을 경시하는 풍토가 만연합니다. 과목을 서열화하는 것 또한 교내 서열화와 맥락을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이나 체육, 음악, 사회 등의 과목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요과목의 점수를 지나치게 줄 세우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오연우 (이화여대 교육 2) : 같은 맥락에서 진로직업교육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진로를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줄 세우는 입시위주의 분위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진로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진로교육처럼 단편적인 자료만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와 관련한 특강형식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강사 분을 초청하거나 직접 체험하는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이미 서열화된 교육구조를 와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유학기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우려처럼 자유학기제가 단순히 시간낭비로 소비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다채로운 직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강유정 (이화여대 교육 2) : 수준별 학습과 같이 이미 서열화 된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려면 수월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상대평가가 아닌 다른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의 가치관이나 학교의 풍토가 서열화를 부추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진로직업교육을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④ 광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공수진(행정 2): 안녕하세요.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모습은 여러 면에서 우려할 만할 일입니다.

헬조선을 힐조선으로 변화시키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공정 사회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제도가 확립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된다면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는 경험

조영신(행정 2): 몇 년 전 한국에서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고 여러 철학자들의 주장을 알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해보는 시간은 의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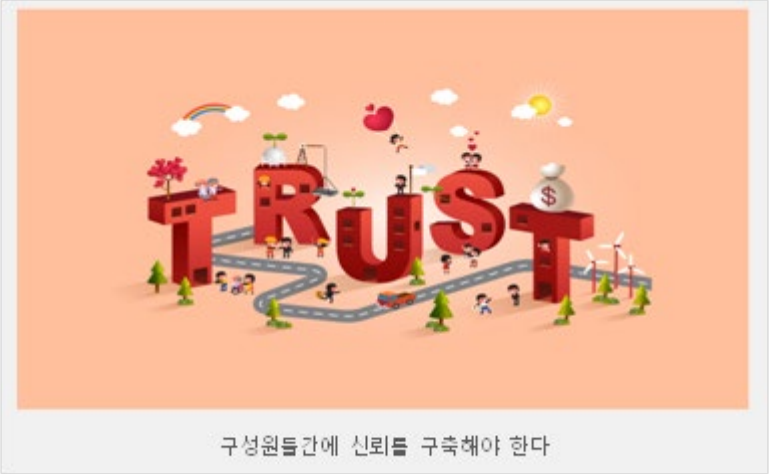
저는 사회과학에는 완전한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이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는 토론 수업을 어린 시절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서 완벽한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토론 준비 과정, 논쟁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혜림(행정 2): 저 역시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합니다. 교육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토론 수업에서 간단한 사례에 대한 토론을 한다면 학생들은 큰 부담 없이 고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선영(행정 2): 저도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하는 것에 앞서 사람들이 공정한 시선,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간에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공정한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정 정책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확립하기 이전에 보수, 진보의 입장과 근거를 모두 꼼꼼히 따져보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언론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언론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시각을 가지지 않도록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영(행정 2): 저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교육, 주체적 시각이 필요성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저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공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기타 정보 기관들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는 정확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박지혜(행정 2): 저는 공정한 사회라고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고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도니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 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도한 경쟁이 일어난 경우 사후 대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진(행정 2):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사례를 통해 고민해보는 토론식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견, 언론 기관의 정확한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의견 모두 감사합니다.

사전적 예방이 교육이라면 사후적 해결 방안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판결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을 위해서는 주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⑤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권혁찬(경제 3):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헬조선이라는 말이 우리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수저계급론, N 포세대라는 신조어와 함께 쓰이며 젊은이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포자기의 심정이 젊은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확대 재생산 되는 것에 대한 가장 주효한 원인은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비관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론,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생산성만큼만 임금을 지급받는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김현우(경제 3) : 우리나라는 해고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선 과소고용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감도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과 같이 생산성만큼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기업측에선 성과가 악화될 때 저 성과자에 대한 연봉부담을 줄임으로써 과소고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낮다면 비정규직보다 더욱 낮은 임금을 적용받을 것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문제점으로 알려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 일자리 부족 등의 각종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국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임금경직성으로 고용시장의 활력이 떨어져 있다.

송지석(경제 3) :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이미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생산성만큼 임금을 지급받자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 개혁을 이루어냈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을 측정하는 구체적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봉협상시에도 많은 난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용시장의 유연화, 특히 임금의 유연화를 시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반발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기득권층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할지가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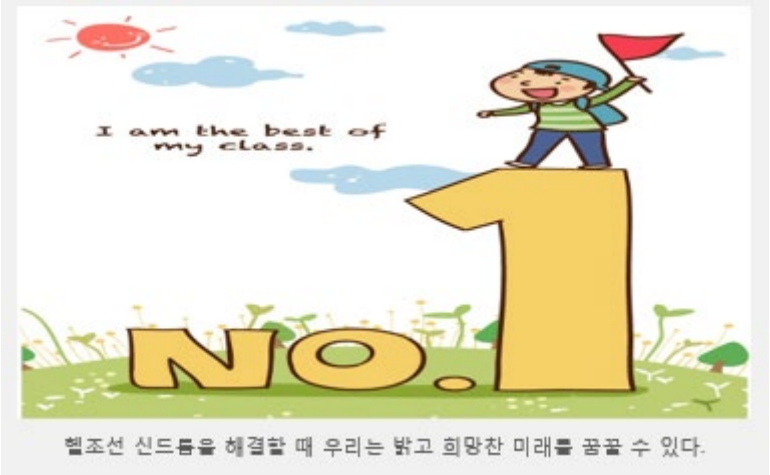
임동민(경제 3) : 이러한 임금의 유연성이 확보될 때 고용안정성은 어떨까요? 흔히 노동시장의 개혁을 이야기하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되고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산성만큼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동일 직종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크게 생산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직이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년과는 관계없이 나이가 많더라도 생산성만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연공서열제로 인해 근속연수가 높은 근로자가 생산성을 월등히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기업에 드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유연화된 상황에서는 고도의 고용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광민(경제 3) :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생산성만큼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개혁을 이룰 때 우리나라가 진짜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은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열악합니다. 현재라도 시급히 노동시장의 통 큰 개혁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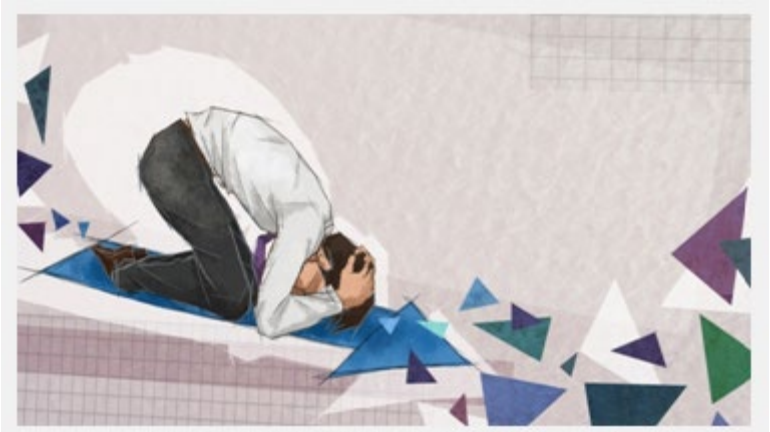


헬조선 신드롬을 해결할 때 우리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권혁찬(경제 3) : 여러분들의 말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생산성만큼 임금을 지급받아야 헬조선에서 탈피하여 희망차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는 뼈를 깍는 노력과, 엄청난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반대와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 계속 헬조선으로 남을수도, 아니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⑥ 건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젊은이들의 사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심각하다

김다솜(건양대 국방공무원 2)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건양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 내에서 'hell(지옥)'이라는 말과 우리나라를 뜻하는 '조선'이라는 말이 합쳐진 'hell 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특히 우리 20 대들의 미래에 대한 좌절감과 나라에 대한 실망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hell 조선'을 만드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분명 'hell 조선'의 탈출구가 있다고 봅니다. 'hell 조선'이 아닌 'heal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장제도의 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자리가 없어 추첨으로 원아를 뽑는 공립 유치원을 시도별로 늘려 모두가 교육비 부담 없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소희(경찰행정 2) : 사회적 불평등 구조로 국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최근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계급이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론'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에게 투명한 세금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자들의 인식변화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김시윤(경찰행정 2) : 사회적 불평등 구조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남녀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2017 년까지 여성 고용률을 61.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시몬 드 보부아르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직장 내 여성 평등 구조 확산과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차별을 조장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의식을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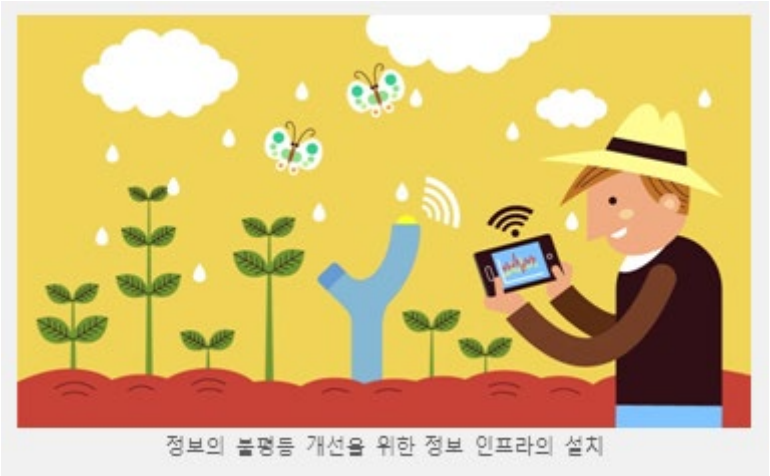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되물림 되어서는 안 된다.

강민주(경찰행정 2) : 저는 아이들의 미래에 중요한 교육문제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학교 소재에 따라 행해지는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수준 차이가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내 학생 수를 지금보다 줄이는 등 공교육의 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은비(국방공무원 2) : 우리 사회에는 재산이나 권력, 명예처럼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자원이 많이 존재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기에 불평등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종류는 많지만 대표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로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와 안산에서 다문화 가정 축제를 여는 것처럼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많이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보 인프라의 설치

서정연(경찰행정 2) : 저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 중 현대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 불평등 문제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농어민을 위해서는 지역 내 정보 인프라의 설치를 해주고,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강좌를 여는 것입니다.

강민주(경찰행정 2) : 공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학에서도 '호롱불'이라는 봉사 동아리가 글을 못 읽는 분들을 위해 글을 가르쳐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교적 정보매체를 잘 다루는 대학생들이 나설 수 있게끔 대학이 도와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현주(국방공무원 2) : 저는 고은비 학생의 의견에 덧붙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공교육을 통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근 늘어나고 있는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됨에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교육을 통해 그러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소수자라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 스스로 당당하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건양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hell 조선'이라고 느끼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사회적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해결책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장제도의 질 개선과 부를 가진 부자들의 인식개선이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엄격한 제도의 시행으로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 남녀차별을 탈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교육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공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교육수준을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의 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보 인프라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선진화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⑦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헬조선' 탈출구, 바로 열린 교육입니다.

김덕규 (경희대 프랑스어학 1): 안녕하십니까?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금수저, 흙수저 등과 같은 수저계급론,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화제인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크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헬조선'으로부터의 탈출은 지금의 닫힌 교육을 열린 교육으로 전환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열린 교육으로의 전환법은 무엇입니까?

김도영 (경희대 원예생명공학 1): 우선 철학과 예체능 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국영수 과목의 학습량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대학 입시를 위해 예체능 수업 시간이 국영수 수업으로 대체되는 실정입니다.

또 암기식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은 문제 푸는 기계로 자라고 있지 생각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바깔로레아의 철학 문제를 보면 프랑스 국민이 어릴 때부터 교육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철학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박성수 (경희대 일본어학 1): 동의합니다. 우리 학업량은 불필요하게 많으며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세대'처럼 불필요한 학업량을 줄이자는 시도는 좋다고 봅니다.

학업량이 방대하다보니 사교육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국어의 경우, 문학 작품의 특정 어휘가 갖는 의미를 외우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학 수업이 암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학과 영어의 고난도 문제를 학원에서는 공식화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지은 (경희대 기계공학 2): 동의합니다. 학업량이 방대하다 보니 사교육이 커집니다. 지금의 학원은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기출 유형이 정해져 있고, 배우는 양도 많다보니 학원의 도움 없이는 경쟁에서 이기기 너무나 힘듭니다.



김덕규 (경희대 프랑스어학 1): 사회자가 아닌 연구모임의 일원으로서 한 가지 생각나는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프랑스처럼 대학 평준화가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프랑스도 그랑제꼴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학계나 전문 분야로 진출할 소수 엘리트에게 해당할 뿐 모든 국민이 입시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학문에 뜻이 있는 소수를 위한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나머지 대학은 모두 평준화를 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이지은 (경희대 기계공학 2): 취지는 좋지만 수도권에 각종 행정 및 문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현실을 생각한다면 대학 평준화를 해도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따라서 각 대학의 교수진 수준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학 평준화 이후 각 대학의 교수진을 현 공립 중고등학교의 경우처럼 무작위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로테이션하면 어떨까요? 수업의 질을 모두 평등하게 하여 대학 간의 위계질서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조소영 (경희대 디지털콘텐츠학 3): 여기에는 국가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대학의 교육 서비스를 평준화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모든 학생이 같은 길로 갈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독일의 경우처럼 직업학교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3 년가량 배워서 취직하는 방안이 아니라 최소 7 년 이상 전문적으로 교육하여 분야의 장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지향할 때입니다.

김도영 (경희대 원예생명공학 1): 이과생으로서 물리, 미적분을 수치로 받아들이기 위해 1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학문이 전문화되고 있어 고등학생 때 접하지 않으면 관심 분야 리스트에 오를 수도 없는 분야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다양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론적, 학술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야들을 학교에서 최대한 많이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박성수 (경희대 일본어학 1): 다양한 교육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학업이 반, 동아리 활동이 반이라고 합니다. 관심 진로에 대해서 간접적 체험을 하기에 동아리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의무적인 수업 시수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수업 시수 자체를 확대하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일본의 경우 야구 인프라가 교육계에 퍼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체육 시설에 야구장이 있는 학교는 몇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이지은 (경희대 기계공학 2): 또 체험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 교육을 중고등학교에서 간단한 영상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강남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안전교육을 학생들의 역할극을 통해 진행하여 그 효과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육은 모두 이론 위주이며 이를 평가하는 방식도 모두 문항에 답하는 단답형입니다. 경험 위주의 교육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Tony Rahman (경희대 화학공학 1): 이와 더불어 입시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권과 대안을 주어서 패배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입학하는 3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이 우수한 10% 이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을 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수능을 통해 3 개 대학에 지원하는 것, 세 번째는 3 개 대학에 모두 낙방할 경우 대학의 자체적인 개별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 수시와 정시가 있지만 수시는 너무 복잡하다고 들었고, 정시는 수능 하나로 모든 것이 결단 나는 형태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만한 높은 성적을 거둔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패배자가 되는 교육 구조입니다.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서 n 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소영 (경희대 디지털콘텐츠학 3): 앞에서 다양성을 강조하셨는데요, 한국의 획일적 방식의 one-way 입시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초등 6 년, 중등 2 년 이후 고등학교로 가기 전 시험을 봅니다. 과학, 수학, 영어 3 가지 분야의 심화반을 뽑는데요, 자신이 수학 심화반이면 수학만 심도있게 강의합니다. 나머지 과학과 영어는 평범하게 수업합니다. 이는 과학과 영어 심화반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과학, 수학, 영어 심화반 학생들은 이때부터 자신의 전문 분야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가 4 년으로 이루어지는데 2 년은 의무이며 2 년은 선택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찾고 이후 대학으로 곧장 진학할 수 있죠.



김덕규 (경희대 프랑스어학 1):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특수학교를 제외하여 대학 평준화를 통해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교수진 Rotation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의 질도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입시 스트레스를 완화한 상황에서 철학과 예체능 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국영수 과목의 학습량을 줄여 생각하는 인간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대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이후 독일의 경우처럼 직업학교를 전문적으로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은 동아리와 같이 체험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입시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권과 대안을 주어서 패배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교육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교육 혁신을 통해 '헬조선'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귀한 정책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⑧ 한성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박상희(한성대 무역 3): 안녕하십니까.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고도의 물질적 성장으로 가난한 나라가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정신적, 물질적, 제도적으로 모순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서열화되고 획일화된 사회에서 비교하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성향과 행복이 더 중요해지고 기준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지정된 틀에서 경쟁을 시켰을 때 더 잘하는 친구가 있고, 포기해버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정된 같은 틀안에서 모두를 경쟁 시키지 않았나. 실패하는 사람을 포용하지 않았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안정민(고려대 사학 2): 현재 청년들은 취업할 때 공무원 및 공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오게 된 이유는 복지,연금, 정년보장, 저녁있는 삶 제공 등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데요. 이는 반대로 공무원 공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대부분 저녁있는 삶이 제공되지 못하며 야근수당도 없을 뿐더러 복지 제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호하는 기업이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종의 질'을 향상시켜 평준화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서비스업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박세윤(서울대 국문 1): 그 중 여자들은 육아휴직때문에 공무원 공기업을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기업 대부분이 임신을 하거나 아기를 출산한다면 육아휴직을 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없다는 문화에 있습니다. 오늘날 육아휴직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학우가 말한 업종의 질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여성이 출산을 해도 복귀할 수있도록 명확한 규율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재취업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경력단절이 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봉주영(중앙대 경영 3): 우리 미래세대가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업종의 질'을 평준화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업종 간 비교 했을 때 '공정한 분배구조'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는 만큼 얻어가는 분배구조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업무의 강도에 비해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는 당연히 사회의 구조와 불만을 갖게 됩니다. 다른 업종은 강도가 약하지만 자신이 받는 것보다 많다면 당연히 일하고 싶은 유인동기가 사라지고 자신의 직업선택을 등한시하게 될 것입니다.


선호하는 직업이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예슬(숭실대 경영 3): 저는 보다 다양한 사회로 미래세대가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진로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중, 고등학교에는 정신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실이 있지만 그보다 다양한 진로로 학생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문상담가가 아닌 각 학교에서 인정받은 지도교사들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자리와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상담가도 유능하지만 지도교사는 다양한 제자들이 사회에 나간 경우를 보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보다 현실성 있게 상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로상담에 있어서는 자신이 상담하고 싶은 지도교사를 두어 학생들이 심화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안종태(경희대 무역 2): 다양한 사회로 미래세대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진로상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교육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의 특성화 전략이 뚜렷해야 합니다. 수능을 보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고도화된 기술을 배우거나 ,학문을 더 배우고 싶거나, 하는 고등학생을 보다 다양화하고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문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학교, 취업과 연결되는 실질적 실습 중심의 학교, 예체능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학교 등 좀더 범위를 넓혀 다양한 직업군과 진로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재우(한양대 신공 2): 아무리 고등학교, 대학의 특성화 전략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대학교에서는 대부분 교수수업평가지표가 매 학기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식문항은 공정성의 문제나 대충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관식란의 평가제도를 통한 익명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류민정(성균관대 글경 2): 위 학우의 말에 덧붙이자면 교육의 질을 제도를 통해서 높일 수 있지만 교육자의 기본 인성과 태도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무리 지적인 소양이 높은 교육자일 지라도 인성이나 태도가 그릇된다면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승(건국대 경영 3): 교육이란 것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지적인 소양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같고 지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권력을 내려놓고 배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령 몇몇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무식하거나 무지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는 학생들이 오히려 수업내용을 받아들이는데 반발만 갖게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됩니다. 또한 가끔 교수나 선생님이 제자를 성희롱하거나 '인분교수'사건과 같은 권력을 이용한 갑질이 논란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정말 소수의 그릇된 교육자를 걸러내기 위해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그 방안으로 평가제도가 대부분 객관식인데 인성과 태도에 관한 문항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민정(성균관대 글경 2): 저는 좀더 다양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청년들과 기성세대 간의 갈등해소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과거에는 국가와 우리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중요해서 획일화된 제도와 상황으로도 불만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보다,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이 더 중요시 되고 개인의 삶의 질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현 청년들의 가치관과 제도는 서로 충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의 문제를 쉽게 보지 말고 진지하고 고민해주고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의 입장에서는 노동개혁과 같은 실질적인 양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희(한성대 무역 3):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획일화 되지 않고 다양한 직업을 갈등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의 질'을 골고루 높이고 '공정한 분배구조'를 통해 갈등없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등학교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청년과 기성세대와 같이 서로 개개인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⑨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대학생이 꿈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토론모임이 개최되었다.

송지나 (동아대 경영):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헬조선'이라는 말 한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조선이란 '우리나라가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임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각자 개인이 마주치는 불합리한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는데요, 뉴스나 기사 댓글에 흔히 이 단어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단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대학생들마저 헬조선에 공감하며 미래에 대해 자조적인 모습을 보여 헬조선을 벗어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헬(HELL)조선이 힐(HEAL)조선으로 가기 위해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연(계명대 통계 4): 많은 학생들이 스펙주의와 학벌주의가 만연한 취업시장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전해보기도 전에 이미 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포기해버리는 사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한 것에 대해 서로 격려해주는 사회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지나친 '경쟁의식'에 지쳐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남들 만큼, 혹은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미래를 걸고 시험을 치르고,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초,중,고등학교 만큼은 경쟁장소가 아닌 학생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시스템은 학생들을 성적으로 평가하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소위 '스펙관리'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관행들은 학생들의 자의식과 가치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숫자에 의한 경쟁이 아닌 내면의 성장을 위한 교육시스템으로의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단순히 설문조사등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가려내어 상담을 해주는 방식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참된 어른으로의 성장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신상담 및 고민상담 등을 정기적으로 해주어 숫자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의 관심과 애정을 주어야 합니다.

이보람(울과대 유아교육 1): 최소연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개선이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해서도 효과가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역시 학생들의 꿈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야 말로 학생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이므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취업을 위해 학생들은 수백만원의 돈을 토익, 자격증, 학원등의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대학생의 수저론은 이와 같은 스펙중심의 취업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은 부모님의 뒷받침으로 편하게 취업을 준비하고, 외국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제대로된 스펙을 쌓을 경제적 여유도, 시간적 여유도 없으므로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보다 취업을 못하게 되고, 다시 가난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개천에서 용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교내외의 장학금을 단지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과 소득분위를 적절한 퍼센테이지로 함께 고려한 뒤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등록금에서 깎는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만큼은 국가장학금이나, 학교등록금과는 상관없이 노력하는 학생들의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와 맞을 것입니다.



탈스펙으로 변해가는 현 취업시장에서 역시 학생들의 금지원은 필요하다

이승현 (울과대 간호 4): 현재 탈스펙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앞으로의 취업시장에서 학생들에게도 꿈을 위한 지원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스펙중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어점수나 자격증, 학벌만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경제적 사정으로 취업준비가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보다 부족하더라도 뽑아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탈스펙이 대학생들의 수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존의 취업제도보다는 개선되었고, 기업이 좀 더 적재적소의 인재를 뽑을 수 있게 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도 학생들에게 경제적 사정의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패널티를 최소화하고 못살던 잘살던 학생들의 삶을 주어진 틀 안에서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나가는 능동적이고 풍요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꿈과 목표를 세우고 경험할 '기회' 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경험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수의 단체 및 기관에서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는 자신이 알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탐방계획서를 작성해 지원한 다음 발표와 면접을 거쳐 뽑힌 학생들에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는 대외활동이 있습니다.

소수의 선발된 학생들에게만 지원되던 이 활동을 각 대학교와 교육청 등 실시하는 기관을 늘려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자신의 꿈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활 4 년 동안 취업이라는 한가지 목표만을 보고 달려가기엔 너무나 멀고도 지치는 과정이 될 것이며 결국 장기적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남'에 의해 평가받고 채워지는 또 다른 헬조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이 아닌 풍요로운 삶을 위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취업에 맞춰서만 지원해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진정 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것에 대해 고민해보고 경험할 기회를 주어서 모든 학생들이 취업이라는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버스시스템을 개선시키고 싶다' '한국적이고 직관적인 웹브라우저를 만들고 싶다' 등의 주체적인 목표나 벤처창업과 같은 다양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송지나(동아대 경영 3): 학생들의 꿈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숫자에 의한 경쟁이 아닌 정기적인 고민상담 및 정신상담 등 내면의 성장을 위한 교육시스템으로의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교에서도 성적만이 기준인 장학금뿐만 아니라 성적과 소득분위를 적절한 퍼센테이지로 함께 고려한 뒤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등록금과 국가장학금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의 경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장학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취업만을 목표로 삼는 학생들이 좀 더 희망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고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단체와 기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헬조선의 출구는 다름아닌 '꿈'을 꿔볼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사정과 단순한 숫자에 의한 평가가 아니도록 기업과 정부, 그리고 어른들이 다독여 준다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더이상 포기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4 차 울산지역 선진화 연구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한림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용지수(한림대 언론 3) : 안녕하십니까. 춘천 지역 거주 학생들과 함께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20 일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98 차 월례토론회를 주제로 전문가와 대학생들의 토론회를 개최해, 요즘 젊은이들에게 닥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발전을 이룩해낸 우리 경제는 현재 저성장의 굴레에 갇혀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선배 세대들이 짧은 기간 동안 최빈국에서 10 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킨 조국을 ‘헬’ 즉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은 여러 면에서 번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나친 비교, 경쟁, 서열 사회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다수가 절망하는 분위기를 유발합니다. 또 우리 사회는 개개인이 아닌 한 사람의 가정, 가족, 배경을 지나치게 인식해 구성원을 서열화 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헬조선’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갓 20 대로 들어선 싱그러운 청춘들을 서열 매기고, 지나친 경쟁의 궤도로 몰아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턴가는 ‘기업의 노예’가 되어, 학문의 전당이라기 보단 취업사관학교라는 명칭이 더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차고 넘치며 진학률 또한 80%를 오르내리지만, 그 존재 이유는 변질 되었습니다. 인문, 사회과학은 ‘경영화’ 해야 살아남습니다. 교양과목은 취업을 위한 매너로 전락했습니다. 국문과목 조차 영어로 가르칩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학점 관리와 취업을 위해, 과제부터 대외활동, 공모전, 봉사활동, 인턴십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스펙 쌓기를 해야 합니다. 학문을 탐구하지는 않지만, 부모 세대에 비해 몇 배는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합니다. ‘공부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대학이 유발한 헬조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구조를 구축한 대학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종현 (한림대 언론 3) : 저는 우선 대학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취업 준비를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학문적 지식의 제공을 목표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대학은 학생 개인의 자아와 교육적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고 '학문적 성취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곧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능력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용지수 (한림대 언론 3) :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 '학문적 성취감'을 제공한다면, 학생 개개인은 본인의 인생에 대한 학생 개인의 가치 판단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획일화된 행복의 기준은 다양해질 것이며, 저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르기에 비교, 경쟁적 사회 분위기도 완화 될 것입니다. 원종현 학우는 대학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시를 들어주세요.

원종현 (한림대 언론 3) : 우선 학문적 성취감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전공'을 말 뿐이 아닌,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게 하는 교육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학과에서는 취업을 위한 실무 교육으로의 편중을 개선하고, 기업의 신입사원이 아닌 전공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취업률이 아닌 '적성'을 가장 중요시 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문 탐구에 흥미를 느끼도록 대학 수업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합니다.

용지수 (한림대 언론 3) : 네 학과의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개선해야 한다는 원종현 학우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학우 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다인 (상명대 세라믹공예 3) : 저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보다 효과적인 수학을 하려면, 우선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부터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의 쏠림 현상을 타도해야 하는데요.

교육부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초중고 시절부터 적성 검사, 직업 체험 등을 꾸준히 하게 해야 합니다.

중, 고등학생에게는 최소 주 1, 2 회 이상의 직업, 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전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하여, 대학에 진학할 지, 고등학교 때에 전문 교육을 받아 바로 사회 일꾼이 될 지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직업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교육과 직업 분야를 탐색하며, 원하는 직업의 핵심 역량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습관 등을 추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학생들 개개인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지 탐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지수 (한림대 언론 3) : 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 직업 탐색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는 원다인 학우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실제로 주 1,2 회 이상 직접 직업 현장에 투입돼

각 직업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실습해 볼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젊은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획일화된 행복의 기준을 타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박서연 학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서연 (한림성심대 의무행정 3) : 네 저 또한 대학 구조개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요. 바로 '대학 구조 조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 과포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중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해, 부실 대학의 증설, 장년층의 경제 부담, 학생 개인의 심리적, 물리적 불안감 등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하는 80%의 학생들이 모두 '정말 가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부턴가 '대학을 가지 않으면 뒤 떨어지는 사회',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돈을 벌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대학을 안가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대학 구조 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학은 폐교토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학 평가를 통해 하위권에 랭크된 대학을 구조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년 실시되는 평가에서 '5 년 동안 하위 10%에 랭크 되면 폐교' 하는 등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용지수 (한림대 언론 3) : 네, 대학 구조 조정에 대한 박서연 학우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대학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평가는 매우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을 '취업률' 보다는 '학문 제도의 체계성',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감 정도', '학내 연구의 완성도' 등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취업률을 평가에 포함시키는 나라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려면, '동종 취업률'을 따져야 합니다. 대학이나 학과의 목적과 학과의 커리큘럼이 전공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에 알맞은 교육을 했느냐의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처럼 교육부가 어느 날 교수들을 모아서 대학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고등교육평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는 대학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른 나라 교수들도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현장을 방문해보고 여러 가지 항목을 검토하고 권고하는 질적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평가를 인센티브와 연결시키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박서연 (한림대 의무행정 3) : 맞습니다. 또한 학제에 따른 대학의 역할 분리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직업 교육은 전문대학과 폴리텍 대학이 담당하고, 4 년제 이상은 연구목적을 가진 학생들로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유니버시티(University)라고 하면 학사도 배출하지만 석사 이상, 주로 석·박사 위주의 연구중심대학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반면 폴리텍(Polytech)이라고 하면 학사과정입니다. 보통 3 년제인건데요. 석사과정도 있긴 하지만, 직업계열 석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대학이 경쟁을 합니다.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이름만 봐서는 어떤 과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4 년제 대학도 미용학과 같은 직업교육 학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은 반드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용지수 (한림대 언론 3) : 네 대학의 역할 분리에 대한 박서연 학우의 의견도 매우 공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원종현 (한림대 언론 3) : 저는 대학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은 대학 서열에 의한 고용과 임금, 승진 격차를 축소하고 채용과정을 투명히해, 사회에 만연한 '대학 줄 세우기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예시로는 서류, 면접 과정에서의 '학력 블라인드' 제도, 채용 과정에서 외국어 능력, 각종 스펙 이외의 전문지식에 대한 평가 반영도를 높이는 것, 대학교육과 연구에 대한 기업의 투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용지수 (한림대 언론 3) : 네 대학구조개선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신 원종현 학우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원다인 학우?

원다인 (상명대 세라믹공예 3) :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 시 전공보다 대학 간판을 먼저 따지는 문화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간판을 따지다 보니 전공과 취업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졸업 전부터 무슨 일을 할지 다시 고민해야 하고, 취업 준비 기간도 긴 것입니다.

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낮추려하기 보다는, 우선 일자리를 잡으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일자리를 잡는 형식의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 핀란드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학교를 다니면서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학을 그만 가야 한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일자리를 잡으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일자리를 잡는 형식의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핀란드 같은 경우 대부분 학교를 다니면서 일자리를 갖고 있다학업과 직업활동을 병행하는 문화를 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지수 (한림대 언론 3) : 원다인 학우의 새로운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하고 싶으신 학우분 계신가요?

원종현 (한림대 언론 3) :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대학 줄 세우기를 타파하자는 선상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명문 대학'을 양성하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각 지역에 있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문화와 새로운 혁신의 터전인 대학이 지역적으로 형성된다면, 그 지역의 산업도 문화도 예술도 발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점대학 안에서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구성해 연구도 하고 박사과정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 분야만큼은 여느 수도권 명문대 못지않은 수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지수 (한림대 언론 3) : 네. 지방에 명문대학을 양성해 국토균형발전과 대학 줄세우기 타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원종현 학우의 의견은 지방대학에 다니고 있는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네요. 아주 좋은 의견을 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의 의견을 더 발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산업계의 취업자격으로서의 학력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대학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군에 한해선,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고졸 노동자, 전문학교 졸업 노동자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이전에,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 예시로는 고졸 직원의 정규직으로 채용 권장 정책, 쿼터제 장려 정책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직업에 대한 전문화 학교를 만들어, 특정 직업으로의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학 구조의 개선은 오래전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생 자녀가 없는 사람들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학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대학과 관련 없는 사람들'과도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고교 졸업생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에서, 고등교육기관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그들 자율로만 맡겨둬서는 안됩니다.

오늘 대학 구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발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⑪ 용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노동임금 구조개선이 헬조선을 탈출하는 답은 아닐까?

장대혁 (용인대 2):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들의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취업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답답해하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비롯된 용어로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젊은 청년 세대들은 작금의 사태를 견디다 못해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헬조선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임금 구조개혁이 헬조선 탈출의 근본 해법이라 생각하여 이를 정책으로 제안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노동임금 구조개혁은 일반적인 전체의 임금이라기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와 최저 임금 등에 국한시키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임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OECD 중에서 낮은 편이 아닌 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제시한 주제에 동의하시는 동의하지 않는지를 말씀해주시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서경 (성균관대 4): 저는 노동 임금 구조개혁에 동의합니다.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을 펼쳐도 현재의 저성장과 경제 불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고용을 늘린다고 하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며 경영상의 이윤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기업들의 행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더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손하경(고려대 3): 저 역시 이에 동의합니다. 노동자와 소비자가 같은 인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는 거 같습니다.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내수 침체는 장기화될 것입니다.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판매에 더 적극적이으로 나가 매출을 끌어올린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타격은 없겠지만 내수 시장도 진작되도록 신경쓰며 이윤만을 추구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인식조차 자본에 팔아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윤 추구라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으면 합니다.



노동자가 살아나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허송주(아주대 3): 앞에 말씀해주신 두 학우 의견과는 저는 조금 다릅니다. 노동 임금 개선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고 오히려 정부가 지향하는 노선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의 친기업 성향을 버리게 된다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경우 기업의 실적이 예전만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현재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아영(중앙대 3): 맞는 말입니다. 덧붙이면 저 또한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서 임금은 결코 낮은 게 아니며 OECD 평균을 봐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집값과 교육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 둘을 정부가 잡아준다면 현재의 노동 구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소비가 진작되며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에서 취업난의 문제는 제쳐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송해용(아주대 3): 저는 노동 임금이 아닌 다른 부분을 지적하신 앞의 학우 두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값과 사교육비가 과연 정부의 힘만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싶습니다. 이는 시장의 논리로 작동하는 시장이기에 정부가 개입은 악영향만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젊은층들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이는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도 악재입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서 임금 격차가 대기업과 최대한 줄어들어야 건강한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송주(아주대 3): 노동자 임금 구조 개선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결국 임금을 올리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교육비와 주거비를 잡지 못한다면 무의미해집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위험요소입니다.

이런 위험요소까지 고려한다면 당연히 임금 구조가 아닌 앞의 두 가지를 잡거나 다른 쪽의 근본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쪽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정부가 투자했다가 실패한 신사업이나 쓸데없는 예산 낭비 등을 줄여서 청년층의 취업을 돕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그 대안은 힘이 떨어져 오래뜻 갈 것이다.

조서경(성균관대 4): 비정규직의 줄어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취업 시장은 악화되고 제대로 인력을 쓰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더더욱 어려워지며 대기업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기업이 해외 기업에 밀려 타격이라도 입어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일부 자본가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삶의 행복을 누릴만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장대혁 (용인대 2): 네, 오늘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의 주제는 헬조선 탈출을 위한 해법으로 노동임금 구조개혁이 답인가 였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었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줄이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엉뚱한 정책이나 사업을 손봐서 청년을 돕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시해준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이 둘을 적절히 보완하여 함께 진행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값과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줄어들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면 더더욱 내수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⑫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제 4차 선진화연구모임이 진행되었다.

조준상 (경영 3):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 1, 2,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성장기에 형성된 관행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다보니 '금수저', '은수저', '3 포세대'에 이어 최근에는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헬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희망이 없는 사회로 비추어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학우 분들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들을 해결하고, '헬조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조준상 (경영 3): 우선,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층이동 사다리의 복원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야만 '헬조선' 문제의 근본인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점차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양극화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 다시 정규직이나 대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게 좀 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계층이동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의 경력직 채용에 있어 중소기업 근무 경력을 적극 인정해주고, 정부가 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비정규직,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면서, 직업의 수직적 이동이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방안에 대해 학우 분들의 다른 의견이나 추가로 덧붙이실 의견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유진 (경영 3): 저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력직 채용 시 중소기업 출신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전체 채용 인원 중 일정 TO 를 할당해 채용을 권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근무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하여 청년층이 처음 취업을 할 때 지금처럼 중소기업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면서,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주열 (경영 3): 저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 향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공동협력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각 분야의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강소기업인 '히든 챔피언'을 다수 보유한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기업이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기술 협력 및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앞장섰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자체가 성장해야 그 곳의 근로자들도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수 (경영 3): 저는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은 편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노사정 위원회에서 나오고 있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이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내수시장 확대와 경제활성화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장훈 (경영 3): 저도 최저임금이 지금보다는 분명히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가 좀 더 기업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기간에 10%, 20%씩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차 인상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범규 (경영 2): 또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공기업 위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더 많은 신규인원의 채용을 가능하게 하여 청년층의 실업률 또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가 무조건 손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금 유연한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조준상 (경영 3): 네, 오늘 서울시립대학교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헬조선'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모든 학우 분들이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참신한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종합했을 때,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력직 채용에 있어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가산점을 주거나, 일정 TO 를 할당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협력모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탈출하고, 다 함께 가는 '힐조선'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⑬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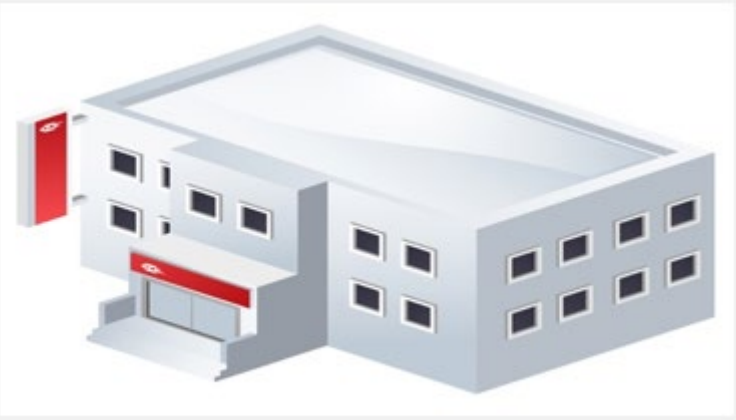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최현수(예술 3):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서울지역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1 월 20 일 명동은행회관빌딩 2 층 국제회의실에서는 "헬조선, 출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한국 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토론회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가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현 사회의 분위기는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심리가 만연하고 ,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헬조선, 수저 계급론 등의 용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 경쟁사회, 비정상적인 서열화가 되어 가는 것이 어린 시절의 입시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나친 경쟁의식 속에서 살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공서와의 협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창의적이고 실천적 교육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찾을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정부차원의 지원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인성과 예의 위주의 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때에는 꿈과 목표를 찾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창의적이고 실천적 교육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 방안과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외대 어문 3) : 저는 우리나라의 입시 교육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들어오자마자 많은 학생들이 목표와 꿈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꿈을 찾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잘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동국대 경영 2) : 저도 수민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교육이 진로, 혹은 미래의 직업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만 한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식 전달형 교육이라는 것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예처럼 실용주의와 창의적 교육을 결합하여 자신이 직접 생각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울 때에도 자기가 직접 생각하는 버릇을 기른다면 후에 직업이나 미래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천적 교육이 중요합니다.

오상민(건국대 경영 3) :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학교가 다양한 기관과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소방서, 경찰서와 같은 관공서는 물론이고 기업과도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과 직업 체험, 실제적인 교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단체들과 협약을 맺어 교류한다면 자신의 미래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여주(서울여대 경영 3) : 저도 학우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한 단체와 여러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군부대, 관공서, 기업등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파견하여 아이들의 체험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현수(예술 3) : 저도 학우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유치원, 초등학교 때에는 인성교육에, 중,고등학교때에는 꿈과 목표를 찾는 교육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지 직업에 대한 탐구가 아닌 창의적이고, 자아확립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 학우의 말씀처럼 미래 직업에 대한 교육뿐이 아니라 직접 생각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이 갑니다. 또한 오상민 학우와 정여주 학우의 말씀처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과 관공서, 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해결방안을 통하여 지나친 경쟁사회, 비교사회를 탈피할 수 있고 헬(HELL)조선이 아니라 힐(HEAL)조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에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진화 과제 39: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

(제 100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권순형(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중국과 일본의 경제 악화가 겹치고 있고 저유가로 인해 산유국들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지 8 년여가 되어 가는데도 세계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경제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분야는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사상 초유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이 상당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의 정체 내지 감소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은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국회에서는 법 하나 통과시키는 것도 너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제 100 차 월례토론회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발제자인 윤창현 교수는 "커다란 경제 위기 앞에서 '큰 거 한방' 식의 정책이 아닌 시행 가능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혁을 추진하며 수도권 규제 자체를 혁신하고 의료산업 육성으로 보건 헬스케어 분야의 전면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교수는 정부의 투 트랙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내수부양과 아울러 환율에 초점을 둔 통화정책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여 일단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머리를 맞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자인 김상조 교수는 “구조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나 그 이익은 불확실하여 구조개혁의 단기적 비용을 감내할 유인을 주어야 하며 비판세력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해 주어야 제로섬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통의 분담’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자인 배상근 부원장은 “한국경제 위기의 해결책으로 성장(일자리 창출)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혁파와 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긴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갈등해소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 법·제도,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인 현진권 원장은 “한국경제의 문제는 국회가 점차 반시장적인 입법으로 가고 있으며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두 좌편향적 사고를 하는 ‘정치실패’”라고 진단하며 “‘자유화’를 최고의 가치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한국은 절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실업처럼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적 고통도 없습니다

2016 년 청년실업률이 9.5%를 기록하며 16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실업은 개인에게 피부에 와 닿는 큰 경제적 고통을 주며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방해가 됩니다. 최근 '헬조선', 'n 포세대'와 같은 극단적인 자조가 전세대적인 공감을 얻는 이면에는 극심한 실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배상근 부원장이 한국경제 위기의 해결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든 것이 공감되었습니다. 생산구조의 자동화와 무인산업 중심의 4 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자리를 나눠서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합니다.



삶의 질과 경제성장을 잡는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합니다

일자리를 나눈다면 우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14 년 우리나라 1 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285 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 위입니다. 과한 노동시간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삶의 질 하락을 야기합니다. 과한 노동시간을 줄인다면 업무능률이 오르고 여가 확보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국가경제도 성장하게 합니다. 작년 IMF 는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증가는 GDP 성장률을 감소시키지만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증가는 GDP 성장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소득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분은 바로 소비로 이어져서 GDP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무소득자가 소득을 올리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원리로 국가경제도 성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생산직은 약 1 억 원의 연봉을 받고 주 60 시간 근무합니다. 여유로운 저녁시간도,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약 6500 만 원의 연봉을 받는 대신 주 40 시간만 일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여유로운 삶이 생깁니다. 1.5 배 늘어난 일자리를 통해 실업 문제도 해결하면서 국가경제도 성장하면 다시 기존의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오르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 폴크스바겐 공장

독일 볼프스부르크는 일자리 나누기의 좋은 예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폴크스바겐 본사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도시 인구 12 만 명 중 5 만 명이 폴크스바겐과 그 협력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도시의 공생이 늘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1990 년대 경영난에 직면한 폴크스바겐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장 해외이전을 모색했습니다. 이에 노조를 비롯한 시민들은 타협책을 내놓습니다.볼프스부르크에서 5 천 명을 더 채용하면 기존 근로자들이 전보다 임금을 덜 받기로 한 것입니다.



잦은 파업과 높은 인건비로 성장의 동력을 잃은 폐허 디트로이트

위기 속에서 도시의 일자리는 오히려 더 창출될 수 있었고, 회사의 실적 호전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은 다시 올라 볼프스부르크는 '폴크스바겐의 도시'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도시였던 미국 디트로이트가 공장 해외이전으로 폐허가 되어 파산에 이른 것과는 전혀 다른 결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잦은 파업과 높은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트로이트처럼 폐허가 되느냐 볼프스부르크처럼 혁신적이고 활발한 도시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우리나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이와 같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이전 대신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규모를 증설하여 연봉 4 천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1 만 개가량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우선 평균 연봉 8 천만 원 정도의 기아차 생산직 정규직 노조의 반발을 극복해야 합니다.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 시 경제효과

생산유발효과	11조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6000억원
취업 유발효과	2만9526명
수출 유발효과	56억3000만 달러

광주형 일자리 추진은 일자리 나누기의 좋은 예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통 크게 양보'해야 합니다. 모두가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기업이 절약한 인건비를 고용에 다시 쓰도록 투자를 강제하는 등 '기득권 내려놓기'에서 손해 보는 집단이 없도록 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나누기'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가경제도 성장하는 선순환을 유발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각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나눈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것도 순식간일 것입니다!

② 김주영(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

한국선진화포럼 제 100 차 월례 토론회에서는 최근 사상초유의 가계부채와 청년일자리 문제 등 국내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 가능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윤창현 서울 시립대 교수는 25 일 한국선진화포럼 제 100 차 월례 토론회에서 주최한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 아래 "커다란 경제 위기 앞에서 '큰 거 한방' 식의 정책이 아닌 시행 가능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창현 교수는 현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자체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보건 헬스케어 분야의 전면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분야의 과포화 상태에 사상초유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구성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토론자 김상조 교수는 구조개혁의 단기적 비용을 감내한 유인을 주어야 하며, 비판세력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해 주어야 제로섬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시적 구조조정의 고통 경감을 위한 적극적 거시경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다각적인 안목으로 접근해 제로섬게임을 피해야 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성장 정책 즉, 일자리창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정책을 통한 분배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혁파와 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긴요하다고 의견을 더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현진권 원장은 한국경제의 문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정치실패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회적 담론을 "자유화"로 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제 자유화를 위해 정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일부에게 고임금이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고용 상황마저 안정적인 상태로 전체적인 구조에 악순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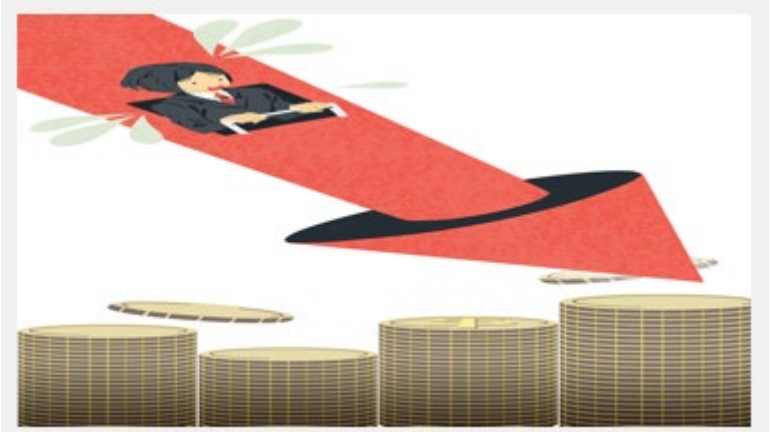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년 일자리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고 노동시장 전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에게 주어진 연 평균 최소 휴가일인 15 일을 모두 쓰는 직장인은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휴가를 모두 다 쓸 경우, 공석을 메우기 위해 16 만 여명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고 합니다. 능률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시간 채우기 식의 노동만을 강요하기 보다는 개개인에게 부여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기존 노동자에게는 충전의 시간을, 신규 노동자에게는 취직의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경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갈등 해소가 우선되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고, 상대를 향해 먼저 손 내밀 수 있을 때 선진 대한민국을 향한 길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③ 김주헌(영남대학교 국사학과)



'위기의 글로벌 경제,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와 국내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자영업 분야의 과포화 상태에 사상초유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도 상당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의 정체내지 감소문제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은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국회에서 법안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어 이제 위기 대응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제 10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 투 트랙적 접근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발제자인 윤창현 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만들고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 변혁을 추진하여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자체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보건 헬스케어 분야의 전면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 트랙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내수부양과 아울러 환율에 초첨을 둔 통화정책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여 일단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행가능한 다양한 정책패키지의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상조 교수는 구조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나, 그 이익은 불확실하여 구조개혁의 단기적 비용을 감내할 유인을 주어야 하며, 비판세력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해 주어야 제로섬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귀족노조에 대한 공격만으로는 승복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미시적 구조조정의 고통 경감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며 '고통의 분담'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야 한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배상근 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해결책으로 성장(일자리 창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나누기'로부터 '곱하기'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성장정책을 통한 분배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혁파와 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긴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갈등해소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 법제도 마련, 사회적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론자인 현진권 원장은 한국경제의 문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정치실패'라고 진단하면서 국회는 점차로 반시장적인 입법으로 가고 있으며,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두 좌편향적사고를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나라이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회적 담론을 "경제적 자유화"를 사회적 담론으로 국민들의 열망을 이끌지 못하면, 한국은 절대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가계부채 등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진적인 문제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많은 위기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도 길이남을 위대한 제국이었던 고구려 역시 내부분열로 인해 멸망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내부의 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계부채는 무려 1200 조 원이나 되는 상황을 비롯하여 고령화로 인해 소비가 구조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등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급진적으로 하기 보다는 계단을 올라가듯 차근차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의 조정, 규제혁파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귀족노조'의 대표적인 예로서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일주일에 60 시간씩 일하면서 약 1 억 원이 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있는 공장은 6500 만 원을 받지만 오히려 국내의 공장보다 노동생산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당 60 시간이 아닌 법적 노동시간인 40 시간을 준수하면서 그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비록 임금은 내려가나 오히려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에따라 문화생활 및 공동체 의식 확장 등 삶의 질이 확장될 것입니다. 임금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청년세대에게 나누어주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 철폐'를 통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규제라는 것은 기득권층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전의 대한항공이 저가항공 진출을 막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진입장벽의 타파를 통해 자유로운 창업환경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놓인 한국경제!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면서 내수시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경제위기를 잘 해결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진출처〉
사진 1 : 이코노믹 리뷰
사진 3 : 헤럴드경제
사진 4 : 입법경제신문

④ 김한슬(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

최근 글로벌 경제와 국내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자영업 분야의 과포화상태에 사상초유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도 상당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의 정체내지 감소문제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은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국회에서 법안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어 이제 위기 대응이 예전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힘듭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10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발제자인 윤창현 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수도권 규제 자체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보건 헬스케어 분야의 전면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투 트랙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내수부양과 아울러 환율에 초점을 둔 통화정책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일단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행 가능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의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토론자인 김상조 교수는 구조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나, 그 이익은 불확실하여 구조개혁의 단기적 비용을 감내한 유인을 주어야 하며, 비판세력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해 주어야 제로섬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통의 부재와 왜곡된 보상구조로,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귀족노조에 대한 공격만으로는 승복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미시적 구조조정의 고통 경감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며 '고통의 분담'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상근 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해결책으로 성장(일자리창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나누기'로부터 '곱하기'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성장정책을 통한 분배에 노력하여야 함을 말했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혁파와 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긴요하다고 의견을 더했으며, 갈등해소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 법과 제도 마련,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현진권 원장은 한국경제의 문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정치실패'라고 진단하면서 국회는 점차로 반시장적인 입법으로 가고 있으며,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두 좌편향적사고를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나라이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회적 담론을 "경제적 자유화"로 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제적 자유화"를 사회적 담론으로 국민들의 열망을 이끌지 못하면, 한국은 절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흔들리는 한국경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저는 현진권 원장님의 의견처럼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가 정치구조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장님과는 달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잉민주화라기보다는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화로 나아가기 전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의 확대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해봅니다.



상생과 행복을 위한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노동시장의 개혁도 늦기 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동안 근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가장 높으며 노동의 질은 아주 나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노사간 갈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남는 시간을 청년고용에 할애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근로자들의 행복도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한 가정으로 보았을 때, 전에는 부모가 혹은 부나 모 한 쪽이 한 집안의 생활비를 모두 벌어들이는 모습이었다면, 경제적 자유화를 통해 부모가 조금 덜 벌더라도 그 자식이 돈을 벌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제도의 개혁입니다. 학업에 뜻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은 대학으로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직업학교에 가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쪽으로 가든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대학? 교육제도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무조건' 대학에 가야만하는 사회는 그 부모에게도 큰 부담이 되어 지나치게 긴 시간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높은 연봉을 받아야만 하는 환경으로 그들을 몰아넣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굳이 대학에 가지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접받고 능력만큼 돈을 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벌 위주의 채용에서 벗어나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에 금이 가고, 여러 내풍과 외풍에 경제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 뭐가 이렇게 많고 짜잘하냐 불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원인-만병통치약' 식의 '큰 거 한 방!' 사고는 오늘날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고치기 위한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방식에서 접근하여 여러 방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정치와 경제, 교육 부문 중에서도 일부에서의 개선방안만을 논의했을 뿐이며,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논의가 생산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과 양보, 화합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수도, 더 잘 살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모두의 소망과 열망처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4: biz.chosun.com

⑤ 김효원(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글로벌경제와 국내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저성장이 장기화 되면서 글로벌 경제와 국내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6%로 추락했고, 자영업 분야의 과포화상태와 더불어 사상초유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도 상당합니다. 또한 청년체감실업률이 22.4%로 여전히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위기의 상황임에도 국내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위기대응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에서 법안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하에 (재) 한국선진화포럼은 제 100 차 월례토론회에서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제자인 윤창현 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혁을 추진해야하며 장기적으로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행 가능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의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교수는 구조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그 이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구조개혁의 단기적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유인을 주어야하며 미시적 구조조정의 고통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거시 정책이 필요하고, '고통의 분담'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상근 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해결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성장정책을 통한 분배에 노력해야 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갈등해소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과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진권 원장은 한국경제의 문제는 경제정책이 아닌 정치구조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를 '정치실패'라고 진단하면서 국회는 반시장적인 입법으로 가고 있으며, 전체 국회의원들이 좌편향적사고를 하고 있다고 했으며 사회적 담론을 '자유화'로 정하고, 정치 자유화, 경제 자유화로 이끌어야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장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하고 경제위기 극복하자.

2015 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7 년 간 노동시장 효율성'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은 20-50 클럽 7 개국 가운데 6 위에 그쳤습니다.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로의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해야 합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대수명증가를 감안해 새로운 고용과 복지 모델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4 배에 달하는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OECD 가 발표한 연금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34 개 회원국 중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고 그러면서도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노인 복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노후 대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터로 나가는 고령층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선 노인 일자리창출과 노인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청년들과 노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늘려야합니다.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옷걸이를 만드는 '두손컴퍼니'와 같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노인들의 노동력이 결합한 사회적 기업이 늘어난다면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함께 창출하고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⑥ 손재정(고려대학교 중국학부)



한국경제, 나아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악화일로에 처한 지금, 한정된 여건과 자원에 비하여 나아가야 할 길은 멀고도 먼 실정에 처하여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한때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경제의 정치화를 지양하고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로 투트랙적인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와 세계적 수요 부족 현상이 맞물려 장기간 경기침체가 유지될 것을 감안하는 한편으로 성장 정책을 유지하여 성장에 의한 분배를 촉진시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양떼가 이탈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죄수의 딜레마 사례를 들어 국내 경제 체제의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켰습니다. 또한 비토 파워에 능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긍정적 지향성을 띠고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창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위치에 있는 이는 사실 젊은이들입니다. 미래의 시간은 오로지 젊은이들에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 일선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인 대학생들의 움직임이야말로 변화의 움직임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화의 추세에 따라 기존의 사회공동체는 해체되어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투쟁하는 오늘, 대학생들이 사회 저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적으로 공인된 단체를 조직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갖가지 생각이 소등하는 사회, 미래를 보장합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확고한 의견을 형성하여 이것이 정치사회에 반영되고, 또한 경제사회, 시민사회의 각 계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결사를 조직하고 운영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란 극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청년들의 의견이 모여 대한민국의 앞날을 만듭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총체적 위기가 압박하여 오는 가운데,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⑦ 오정학(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중국과 일본의 경제 악화가 겹치고 있고 저유가로 인해 산유국들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지 8 년여가 되어 가는데도 세계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경제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분야는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사상 초유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이 상당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의 정체 내지 감소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은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국회에서는 법 하나 통과시키는 것도 너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제 100 차 월례토론회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발제자인 윤창현 교수는 “커다란 경제 위기 앞에서 ‘큰 거 한방’ 식의 정책이 아닌 시행 가능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혁을 추진하며 수도권 규제 자체를 혁신하고 의료산업 육성으로 보건 헬스케어 분야의 전면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자인 김상조 교수는 "구조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나 그 이익은 불확실하여 구조개혁의 단기적 비용을 감내할 유인을 주어야 하며 비판세력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해 주어야 제로섬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통의 분담’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자인 배상근 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해결책으로 성장(일자리 창출)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혁파와 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긴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인 현진권 원장은 “한국경제의 문제는 국회가 점차 반시장적인 입법으로 가고 있으며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두 좌편향적 사고를 하는 ‘정치실패’”라고 진단하며 “‘자유화’를 최고의 가치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한국은 절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미래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유가하락세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신흥국 경제 불안 등으로 제조업 성장이 둔화됐고,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수출도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창현 교수는 4 차 산업혁명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미래 기술 융합을 통한 대변혁과 혁신이 만들어내는 신세계 도래를 예고한 것입니다. 새로운 새로운 산업혁명은 변화속도와 범위, 영향력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므로 광범위한 만큼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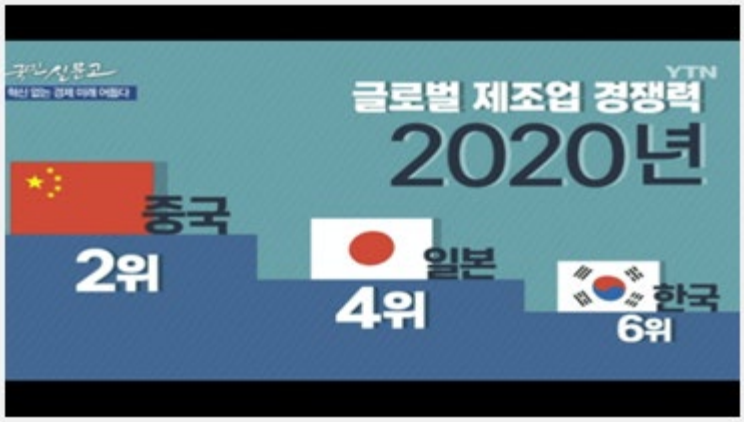
우리의 '4 차 산업혁명'의 방법은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동력 산업의 융복합입니다. 자동차·조선 산업의 정보기술 융합, 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수소·2 차 전지, 에너지저장장치를 비롯한 미래 에너지산업, 3D 프린팅, 게놈산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은 그린카, 스마트카 등 미래형 자동차 부품소재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선해양산업은 'ICT 융합 인더스트리 4.0s'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자재 기업의 국제인증 획득과 벤더 등록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3D 프린팅을 응용한 친환경 자동차부품 사업화 연계 연구개발 기반 구축,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용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개발에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두워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 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킨다면 우리 나라는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여 제 2 의 고속 성장 시대를 맞이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선진국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⑧ 이승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우리나라글로벌제조업 경쟁력이 2020년에는 6위가 될 것으로 전망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내경제도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청년실업, 수출 감소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선진화포럼은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제 10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여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았습니다.

발제자인 윤창현 교수는 중국, 유럽의 경제 악화와 저유가라는 외부의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결책으로서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고, 경제의 정치화를 지양하며,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 포퓰리즘, 경제정치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다음으로 김상조 교수는 협조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벌칙이 없다는 점을 한국의 문제점으로 거론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의 실패 이유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배상근 부원장은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으로 규제가 만연하고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으며, 경제가 정치화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 혁파,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갈등을 해소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진권 원장은 한국경제의 최대 장애요소가 정치권에 의해 경제정책이 결정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유화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셋째에게만 집중되는 출산 장려책은 비효율적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부화뇌동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차분히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장기적인 측면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 년 간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으나 고용이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둘째도 잘 낳지 않는데 셋째에만 출산 장려책이 집중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신혼부부들이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결혼 후의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에게만 주던 혜택 중 일부는 둘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삼성전자와 페이스북의 협력

둘째로, 기업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가상현실 분야에서 페이스 북과 협력하기로 한 사실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그것이 규제에 막혀서 실현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 놓인 지금,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서로 갈등하지 말고 힘을 합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1: YTN
2: 연합뉴스
3: 중앙일보
4: 한국일보

⑨ 이재환(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세계경제 위기! 대한민국도 위기!

요즘 세계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중국 일본 문제가 겹치고 있고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들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지 8 년여가 되어 가는데도 세계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세계경제에 영향을 대단히 받기에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영업 분야의 과포화, 사상 초유의 가계부채,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고 무엇보다 수출의 정체 내지 감소 문제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제 10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경제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발제자인 윤창현 교수는 중국, 유럽의 경제 악화와 저유가라는 부정적인 외부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우리나라가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고, 경제의 정치화를 지양하며,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조 교수는 협조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벌칙이 없다는 점을 한국의 문제점으로 거론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의 실패 이유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배상근 부원장은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으로 규제가 만연하고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으며, 경제가 정치화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 혁파,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갈등을 해소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진권 원장은 한국경제의 최대 장애요소가 정치권에 의해 경제정책이 결정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유화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하더라도 한걸음 한걸음 미래를 바라보며 장기적으로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노동개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임금에 비해서 노동자들의 일의 능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어렵기만 하고 노동자의 권리만 부각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고용주의 권리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장벽에 막혀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고임금 저능률으로 인해서 한국에 투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고용주의 권리 문제 또한 해결해야 노동자의 능률에 맞춰서 임금과 노동시간의 조절이 가능하다면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그에따른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회사와 근로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성장보다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함을 목적으로, 기업은 근로자들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을 결부시킨 채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차이가 벌어져 왔고 그것이 현재까지의 문제로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연봉만 바라보며 눈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하고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투자하며 같이 성장하며 목표를 함께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⑩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최근 글로벌 경제와 국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과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 정체내지 감소문제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은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제 100 차 월례토론회에서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불안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들어보고자 저도 월례토론회에 참석해보았습니다.

윤창현 교수는 현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자체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보건 헬스케어 분야의 전면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 경제 위기의 해결책으로 “성장(일자리 창출) 정책에 초점을 맞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혁파와 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긴요하다”고 의견을 더했습니다.


제로섬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판세력이 듣고 싶은 말도 해주어야 한다!

김상조 교수는 구조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나 그 이익은 불확실하여 구조개혁의 단기적 비용을 감내할 유인을 주어야하며 비판세력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해 주어야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시적 구조조정의 고통 경감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진권 원장은 한국 경제의 문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정치실패라고 진단하면서 국회는 현재 반시장적인 입법으로 가고 있고,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두 포퓰리즘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진권 원장의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장애는 정치권'이라는 주장이 저에겐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치권의 무능 내지는 불능은 많은 분들 또한 공감하실 겁니다. 현재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 있고 여야는 힘을 합쳐 역경을 타개해도 모자랄 판에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대립만 하고 있다

저는 80 년대에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수준이 갈수록 퇴보하는 원인에 대해서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와 드라마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가 막장이고 스토리도 뻔하다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욕을 하면서도 드라마를 챙겨본다는 점이 정치와 유사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낙선이고, 낙선은 유권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정작 욕을 하는 유권자들도 선거철이 되면 늘 뽑던 사람을 그대로 뽑습니다. 시청자들이 보이콧을 해서 드라마를 바꿔야 하는 것처럼 유권자들이 변해야하는 것이죠. 이는 제 자신을 비난하고 제 주위를 비난하는 바와 다름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치를 계속 해나갈 수 없습니다. 5 년 단임으로는 정치권에 안정성을 담보해줄 수 없습니다. 무능한 행정 권력을 뜻하는 레임덕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안정성이 없는 다리를 다친 레임덕(lame duck)

그러나 지금 곧바로 5 년 단임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헌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것보다 기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즉, 이러한 구조적 개혁에 앞서 유권자들의 정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에 면역이 되기 위한 유권자들의 정신적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과거의 역사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수단입니다. 과거에 포퓰리즘이 어떻게 행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포퓰리즘에 대한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당해봐야 그제서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퓰리즘도 몇 번 당해본 사람은 이게 기만인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포퓰리즘을 구분해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치 예방주사를 미리 놓듯이 포퓰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00 년대 중반 발생했던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규모로 촛불시위를 하고 반미, 반정부를 외치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반대했지만 결국 미국산은 수입되었고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우병 걸린 사람을 주위 혹은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도 큰 그림만을 보여주는 이론식 교육이 아니라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기관을 만들어서 선진한국을 위한 무료 강연을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치적인 정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교육이라는 백신을 통해서 포퓰리즘이라는 바이러스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바이러스에 병든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해야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작은 발걸음이 선진 한국으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⑪ 정승훈(단국대학교 철학과)



최근 글로벌 경제와 국내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자영업 분야의 과포화상태에 사상초유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도 상당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의 정체내지 감소문제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은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국회에서 법안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어 이제 위기 대응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힘듭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제 10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윤창현 교수님은 이에대해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혁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셨으며 수도권 규제 자체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보건 헬스케어 분야의 전면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정부의 투 트랙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내수부양과 아울러 환율에 초점을 둔 통화정책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여 일단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게 중요하고 시행 가능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의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상조 교수님은 구조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나, 그 이익은 불확실하여 구조개혁의 단기적 비용을 감내할 유인을 주어야 하며, 비판세력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해 주어야 제로섬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귀족노조에 대한 공격만으로는 승복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미시적 구조조정의 고통 경감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며 '고통의 분담'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배상근 부원장님은 한국경제의 해결책으로 성장(일자리 창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나누기'로부터 '곱하기'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성장정책을 통한 분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혁파와 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긴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갈등해소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 법, 제도마련,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님은 한국경제의 문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정치실패'라고 진단하면서 국회는 점차로 반시장적인 입법으로 가고 있으며,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두 좌편향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은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나라이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회적 담론을 "자유화"로 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유화"를 사회적 담론으로 국민들의 열망을 이끌지 못하면, 한국은 절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단정하셨습니다.

현재 보수-진영 양측은 총선의 승리만을 쟁취하려 하지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며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수-진영 양측은 더 많은 표를 긁어모으려 포퓰리즘에만 의존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임제라 장기적인 정책발전과정을 가질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대해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한국정치”라는 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즘 국회를 보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입법기능에 마비가 오고 박근혜정부는 3 년차에 들어서서부터 레임덕으로 삐끗거리고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제도의 개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는 법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과 행정부 정책진행 부진 현상이 정치제도의 변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선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는 단원제로 상·하원이 나뉘어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진 국회로 나아가려면 양원제를 채택하여 하원에서 입법제안의 과정을 거쳐 상원에서 최종결정해 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상원은 감독하는 체제로 가면 국회의 투명성과 입법과정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5 년 단임제는 너무 짧습니다. New Normal 시대에 맞게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장기적 개혁을 추구하려면 미국과 같이 4 년 중임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정책 결정권자들이 포퓰리즘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한껏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개혁이 국회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제에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정치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오래된 격언처럼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은 새로운 선진 정치체제에서 시작합니다.

⑫ 조형원(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날이 갈수록 경제가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가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라는 말이 어느덧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년 째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다 보니 이제는 힘들다고 아우성쳐도 별 느낌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느끼지만 못할 뿐 국내 경제는 점점 더 조용히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에 가계부채는 폭발 직전이고 좋은 일자리는 시시각각 사라져만 갑니다. 믿었던 수출도 점점 신통치 않고, 정치권은 안이함과 발목잡기 정쟁에 빠져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 는 주제로 2 월 월례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경제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좌장 및 발제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지정토론에 김상조(한성대 교수).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이 참여했습니다.



고용의 변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발제 및 좌장을 맡은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한국 경제에 수많은 위험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뉴노멀의 가능성에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리·현실·효율·성과 중심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창현 교수는 국가 거버넌스의 문제해결, 노동개혁과 성과중심 보상체계, 신 세계화, 자산국가로의 변혁, 각종 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통해 저성장기 제로섬 갈등사회를 극복하고, 4 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고급 서비스업과 기술혁신, 금융개혁, 규제개혁, 의료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된 환율정책과 함께 투 트랙(two-track)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위기를 해결할 큰 거 한 방은 없으므로 시행가능한 모든 정책의 조합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토론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한국 정치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헤게모니 없이 비토권과 담합만 난무하게 되었다면서 극복 방안으로 협조적 행동에는 상을, 기회주의적 행동에는 벌을 주는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나 까레이나 법칙의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제 각각이라는 문장을 예로 들면서 한국경제의 실패 원인은 복합적이므로 단순한 원인파악 및 해결 방식의 접근은 불가능하고,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처방을 리더의 일관성과 팔로워의 인내심으로 견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히 구조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그 이익은 불확실하여 구조개혁으로 희생되는 구성원이 감내할 유인을 주어야하며, 노동자의 항변에 응답하고 비판세력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귀족노조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고통분담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개혁과 자유화를 통해 신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토론자인 배상근 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해결책으로 성장과 성장을 통한 분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나누기'로부터 '곱하기' 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혁파,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이 긴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수출 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한국 제품이 샌드위치 신세에서 샌드백 신세로 전락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 유도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인 현진권 원장은 한국경제의 문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정치 실패로 진단하면서 국회가 무제한적 민주주의로 인해 점점 반시장적 입법과 좌편향적 사고에 매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한국은 선진화를 위해 자유화, 특히 경제 부분에서의 자유화를 사회적 담론으로 설정해야 하고 자유화에 대한 열망을 한국의 시대정신으로 삼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노동정책에서의 계약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대체근로와 파견근로 규제가 오히려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고용주를 고용자로 부르고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권이 협력하여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도 장기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운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지 못하면 그것은 시장에 예측불가능성과 불안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불안감과 예측불가능성은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아무도 투자하고 소비하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강력한 정책 기구를 국회에 신설하고, 한 번 합의된 국가 대전략은 함부로 수정하지 않고 계속 계승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선거와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장기적 국가 대전략이 유지될 수 있다면 경제 리더십도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전체의 토론과 설득 과정을 거치고 피해받는 구성원에게 공동체가 충분히 보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사회 전체가 구조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 없이 대전략을 함부로 수정하는 정치 세력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투표 또는 법적 제제를 통한 벌칙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제도는 국가 전체가 장기적으로 안정적 협력을 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제국이나 대영제국 등의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위기 때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최선의 방향을 찾아내 설득해서 전국민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또한 위대한 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문화를 퍼트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2 출처;
http://public.bokeducation.or.kr/ecostudy/columnList02.do?mode=view&contentId=3473

⑬ 주아람(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우리 경제는 막대한 가계부채와 청년실업문제,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둔화와 유럽의 저금리 기조, 저유가에 따른 전 세계적 수요 감소 등의 외적인 위협 요인들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 위치를 살펴보고,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앞으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는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 100 차 월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 윤창현 교수는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중국 경제의 부진, 유럽 경제의 악화, 저유가와 남북대치라는 대외적 악재들에 의해 우리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조 교수는 한국의 보수-진보 진영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협조를 하지 않아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대한 벌칙 부과를 해야 하며,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집단 간 우호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배상근 부원장은 세계적인 수요 부족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사회적 갈등, 과도한 규제, 고령화, 경제의 정치화로 인해 우리경제의 내수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중심의 개혁과 정치권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진권 원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장 논리에 의한 경제 정책 시행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경제 정책 시행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실패를 벗어나기 위해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아우르는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어 선진 사회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의 정치화로 연해 포퓰리즘성 정책들이 만연해졌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정치 실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고유 영역인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기 위한 근시안적이고 기만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성 경제 정책은 특히 복지 정책에서 두드러집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무상'이라는 단어를 복지 앞에 붙임으로써 실제로도 복지가 무상으로 지급되는 듯한 신기루 현상을 꾸며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상 복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공되는 모든 복지는 정부 재원에서 제공되며 정부 재원은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복지는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비용을 수반하지만, 분배의 과정에서 만약 세금 없이 빚을 내어 '가격'의 기능을 무시한 채, 복지의 가격을 0 으로 만들어 공짜로 제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지의 사회적 가치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 중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복지에 적용해보면, 정부의 재원을 또 다른 복지 부문에 사용함으로써 다른 부문에 사용될 수 있었던 재원을 공급하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와 복지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무상복지나 실현 가능성 없는 감성에 호소하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줄이고 경제를 시장의 논리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이 정책을 제시할 때, 그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해줄만한 재원 조달 방법을 명시하게끔 의무화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권자 즉, 시민들도 포퓰리즘 정책의 허상을 꿰뚫어볼 줄 아는 혜안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와 사회복지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를 어린 나이부터 차근차근 쌓을 수 있도록 경제와 복지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들을 선별해낼 수 있도록 국민 전반적인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부터 최대한 독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⑭ 김덕규(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



뉴노멀을 아시나요?

'뉴노멀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뉴노멀은 new normal, 즉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을 뜻하는데요, 2008 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상한 새로운 경제 질서입니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등이 뉴노멀로 논의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뉴노멀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과거 단기간 급성장한 국가였기에, 뉴노멀 시기에 접어들면서 한국경제 위기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제 10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윤창현 교수는 이 경제 위기를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동원하여 조금씩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단기적 접근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개혁, 예컨대 무인산업에 대비하는 새로운 고용 정책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김상조 교수는 한국경제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 소통과 협동의 정신을 되찾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와 시장의 규칙을 위반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구성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상근 부원장은 소비와 투자 모두 위축되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지적하며, 정치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진권 원장은 한국경제의 정치화 현상을 설명하며, 지금은 경제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정작 국회가 정치 실패의 경험을 하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정치 개혁과 함께 경제의 자유화를 인지하여 각종 규제를 풀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소통과 협동의 정신으로 경제위기 극복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인 급성장을 했지만 정신적 성숙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 시점의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이루었으나, 선진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선진화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높은 사회갈등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김상조 교수가 제시한 소통과 협동의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선,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를 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주당 노동시간은 40 시간이고, 1 주일에 최대 12 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과 국경일 등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죠.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12 시간을 산정하는데 휴일근로를 포함시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뜻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늘리자는 것이죠.

OECD 국가들 중 최장의 근로시간을 기록하지만 그 효율성이 낮은 상황이라, 더욱 일자리 나누기가 시급한데요, 자신의 임금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발합니다. 소통과 협동 정신의 부재입니다.

삶이 퍽퍽해져서 인심이 사라져가는 사회에서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이' 성장하는 사회가 더 행복합니다. 냉혹한 이기주의가 아닌 소통과 협동의 정신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기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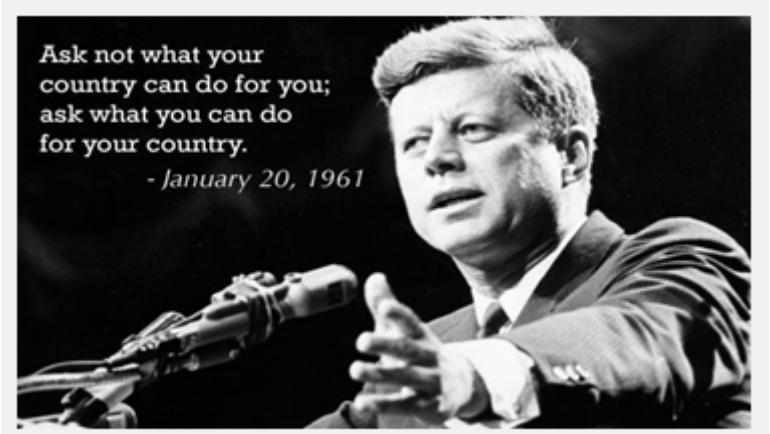
두 번째는 '기부 운동 활성화'입니다. 미국 뉴욕 주는 지난 2009 년 '백만장자세'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여 상위 1%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는 대신 저소득층 세율은 낮추는 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의회의 반대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억만장자 40 여 명이 스스로 의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자신들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라고 요구하는 등 부의 나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 주민으로서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입은 만큼 공정한 몫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의무와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동기가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서 나왔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기부 운동은 각자 살기에 바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빙 플레지 (개인자산의 50%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공개 기부서약 캠페인')를 보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주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부를 내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식 기부 운동은 사회 지도층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운동의 일환이었으면 합니다.

택시나 음식점 몇 곳에서 기부하는 통이 있긴 하지만 곳곳에서 찾아보기는 드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곳들에 기부통을 많이 설치하여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IMF 경제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의 정신을 실현한 나라인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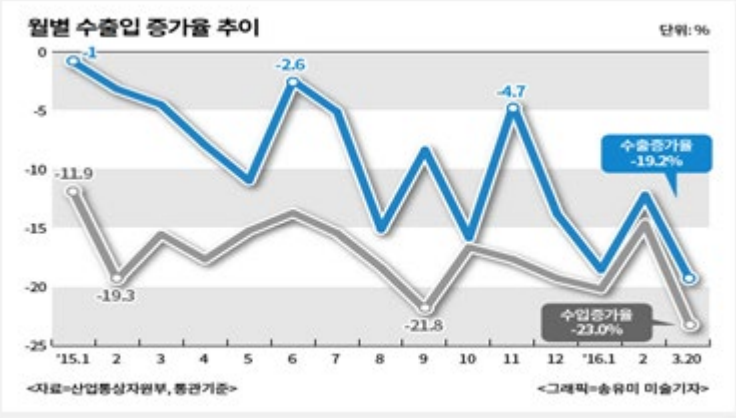
사회의 질을 만들고 바꾸는 것은 구성원의 인식에 기반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강제적인 제도나 규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성숙해야 나라가 성숙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없는 이기심은 물질주의의 병폐일 뿐 결코 우리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수많은 정부의 경제 개혁안과 제도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통과 협동의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나누는 사회라면 충분히 도달했을 결과를 위해서 말입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과 협동의 정신이 있다면 그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회의 창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⑮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5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월간수출액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르디우스 왕의 전차에 매달린 매듭을 아무도 풀지 못하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한칼에 잘랐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은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습니다. 우선 경제부터 말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월간수출액이 15 개월 연속 감소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 성장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수출 뿐만 아니라 내수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지난해 1200 조원을 넘으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고 고령화와 청년실업의 영향으로 2005 년 80%에 근접했던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71.9%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정치도 점점 막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북세력과 운동권세력들은 광우병 폭동, 4 대강 반대 선동, 해군기지건설 반대, 세월호 선동과 불법시위, 광화문 폭력시위, 국정교과서 반대시위, 테러방지법 선동 등을 하며 우리 정치를 아프리카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귀족노조의 반대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파견법 개정, 대체근로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경기가 점점 침체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데도 말입니다.



밥그릇 싸움만 벌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

우리 기업들이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인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또 예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선만을 위해 무책임한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런 특정 정치인들은 정부가 실패하게 만들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권력을 얻으려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 타령을 하는 위선을 보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연임, 중임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절대로 5 년 만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는 12 년 동안 집권하며 몰락하던 영국을 뜯어고쳤고 그 결과 영국이 재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호통을 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이런 대통령의 권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수많은 주체들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데 모두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으니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한테 모든 힘을 몰아주었고 아베 총리는 이 힘으로 아베노믹스를 펼치며 일본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한국에서 구인공고를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경제와 정치를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풀기 어려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뛰게 만들 지도자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등장해야 하며 우리는 모두 힘을 모아 그 지도자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과거의 영광만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처럼 몰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⑯ 장대혁(용인대학교 물류통계정보학과)



한국 경제는 늘어나는 빚과 줄어드는 일자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3 대 뇌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영업과 부동산 그리고 가계부채입니다.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들은 빚을 져가며 연명하는 중이며 부동산 시장 역시 부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거기다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저유가, 저금리, 저물가가 더해 고령화까지 끼얹은 우리 경제의 미래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게 현실입니다. 밖은 어떨까요? 밖의 상황도 우리에게 호재로 작용할 요소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밝지 않은 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타계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하나 그 해결책 중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침체된 경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졸자들을 그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의 사무직이나 대기업의 일자리에 앉히기에는 너무나 일자리가 적습니다.

2015 년 IMF 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증가는 GDP 성장률을 감소시키지만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증가는 GDP 성장률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분은 바로 소비로 이어져서 GDP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소비층이 넓어지기에 효과적입니다.



일자리 공유를 통해 소비 계층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시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라는 시장에는 10 명의 사람이 있으며 이 시장에서 한 명은 1 억원을 나머지 9 명은 100 만씩을 가졌고, 다른 B 시장에는 10 명의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1090 만원을 가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서 시장이 활발해질까요? 사치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생필품과 일반적인 소비재만을 구매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B 라는 시장이 더욱 더 많은 구매가 일어나 활발해질 것입니다.

A 시장에서 많은 돈을 가진 단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생필품과 일반 소비재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이 먹는 것과 입는 것만 볼 때 말입니다.

또한 A 시장에서는 단 한 명을 제외한 9 명이 가진 돈이 적기에 많은 소비를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B 시장에서는 모두가 비슷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금액이 있기에 본인의 양껏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B 시장은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경제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자리 공유를 통해 소득을 제공한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루어지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허나, 단순히 일자리 공유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위해 집값을 낮추고 사교육비가 낮추는 게 근본 해결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자리 공유를 위해 임금피크제에서 양보를 해주거나 또는 적은 임금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들에게 세금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일자리 공유자들에게 세금을 낮춰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일자리 공유를 통해 사회의 공공적 선에 기여를 한 이들에게만 세금을 낮춰주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소득세 등을 낮춤으로써 일자리 공유를 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면 실질 소득에서 큰 손해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일자리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소득이 없는 이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일자리 공유를 통해 임금이 적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세금을 낮춤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철저히 검수해 일자리 공유를 보여준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현 시점에서 임금피크제와 같은 일자리 공유를 위한 기업의 선택은 쉽지 않은 선택이기에 사회 공공의 안녕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힘든 선택을 한 기업에게도 조금의 혜택이 있게끔 일부의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러한 낮은 세금이라는 장치로 일자리 공유를 유도해 고용률을 늘려 실업률을 줄인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소득을 만든다면 침체된 우리 내수가 활성화 되 경제 위기를 타파할 한 줄기 빛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순형(서울대 경제 3) :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영업 분야는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사상 최고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이 상당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수출의 정체 내지 감소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경제의 성공신화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한국경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혁(서울대 경제 4) :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 수준, 글로벌 표준화된 기업 환경, FTA 체결로 인한 넓은 세계시장, 지리적 이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성노조의 파업과 고임금, 지나친 보호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게 합니다. 실제로 2000 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FDI(외국인직접투자)보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FDI 가 더 커졌으며, 그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생길 수 있었던 생산시설과 일자리들을 외국에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는 지금 폐허가 되었습니다

배근표(서울대 경제 3) : 우리는 한때 '모터 시티'라 불렸으나 지금은 폐허가 된 미국 디트로이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 자동차의 미국 진출 등으로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노조는 여전히 높은 인건비를 고수하고 잦은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견디지 못한 자동차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디트로이트는 폐허가 되었고 2013 년에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산업 자체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경쟁이 심화되는 등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도 이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노동자의 권익만 주장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노동자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권순형(서울대 경제 3) : 보통 선진국은 제조업 등 2 차 산업보다는 서비스업 위주의 3 차 산업이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마당에 제조업을 장려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송수혁(서울대 경제 4) : 독일과 일본이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있는 덕분입니다. 우리도 고부가가치, 고숙련 산업 위주로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특정한 하나의 정책으로 국가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시행 가능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 살리기는 그 일환입니다.

홍현기(서울대 경제 2) : 최근 미국도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전비용 일부 지원, 세금혜택, 연구개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제너럴 일렉트릭, 월풀, 포드, 3M 등 200 여 개의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이 필요합니다.

배근표(서울대 경제 3) : 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강성노조의 행태입니다. 노조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힘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성노조는 노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조 결성율은 10% 안팎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편입니다. 이 적은 수의 노조들은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부문 등 근무환경이 좋은 직장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노조와 노동운동은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귀족 노동자들만 대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 혁신이 필요합니다!

박성원(서울대 심리 3) :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큰 혁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경력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도록 하는 식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업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나이든 사람들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그들이 사회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홍현기(서울대 경제 2) : 일자리 나누기도 필요합니다. 가령, 현대자동차 생산직은 약 1 억 원의 연봉을 받고 주 60 시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일주일 내내 일만 한다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현행 법정 노동시간 상한이 68 시간인데, 이를 52 시간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노동자도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대개 일자리

나누기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경제위기에 대한 고통을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도 분담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라는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박성원(서울대 심리 3) :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이 여러분이 언급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효율이 제거되고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어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실업자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이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불경기로 인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20 대 명퇴 사건 등이 계속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사람들은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악용되어 괜히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나누고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노력을 해도 해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송수혁(서울대 경제 4) : 노동개혁의 성과는 노동자에게 단기적으로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개혁 등의 개혁법안을 추진하면서 일반 노동자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업의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근로조건을 조정할 정당성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기업이 절약한 인건비가 일자리 보존을 위해 재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별 노사 관계를 구축!

홍현기(서울대 경제 2) : 일반 노동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동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 아니라 강성노조를 타겟으로 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 강성노조는 지나치게 정치화되었고 비대화되었습니다. 강성노조들은 주로 산별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산별노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배근표(서울대 경제 3) : 산별노조의 파업에 한해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체근로란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기간에 기업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체근로는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기업이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노동자의 경제적 자유권인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기업의 경제적 자유인 대체근로만 원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산별노조는 개별노조보다 협상력이 더 막강하므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박성원(서울대 심리 3) : 노조와 기업의 합의는 당사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로를 잘 아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야 신뢰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개별 노사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 우선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권순형(서울대 경제 3) :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흔들리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저희는 그 중 노동개혁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강성노조는 소수의 귀족 노동자들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과제로의 임금 개편, 일자리 나누기 등의 노동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 노동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에게도 개혁을 통해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개혁을 하기에 앞서 산별노조 파업, 불법파업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강성노조를 타겟으로 한 개혁이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분쇄한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별 노사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손재정(고려대 중국학부 3 학년) : 지금부터 2 월 100 차 월례토론회 관련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 관련하여 대학생들의 토론 주제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청년창업, 어떠한 것이 있는가'로 정하겠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편의상 이하 의견의 전개는 경칭을 생략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보성(고려대 중국학부 2 학년) :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말이 잘 와닿지는 않는다. 나는 원래 꿈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라서 잘 모르는 면도 있지만, 실제로도 청년이 창업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련해야 할 돈이라든지 구하기 쉽지 않다.



남궁단아(고려대 경제학과 4 학년) : 나는 꿈이 웹툰 작가인데 웹툰도 하나의 청년 창업이라고 생각한다. 웹툰은 창의력과 일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청년창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정시찬(고려대 전자공학부 3 학년) : 꿈이 랩퍼인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청년 창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기획사들도 있지만 인재발굴 프로그램이 있듯, 진출하려는 사람으로 그 재능이 확실히 있다면 상업적으로 블루오션을 새롭게 창출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경환(고려대 공공행정학부 2 학년) : 이제 군대로 가는데(웃음) 그래도 청년창업이 남의 일이라 생각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어서 모두들 힘든 시절이고 앞으로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취직을 하지 못하면 자영업을 해야 하는데 창업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손가락 해내에 거는 청년 창업

손재정 : 사실 청년 창업이란 말이 묘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 구축된 각종 기구, 설비, 이 모든 것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여 개인이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는 과정에서 청년 창업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돌파구는 역시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그리고 기술의 혁신이 결합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년창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현실에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보성 : 요새 알파고, 인공지능이 각광받고 있다. 이세돌 9 단과의 대국 이후, 인간 대 컴퓨터의 대결 구도가 확산될 정도로 매우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구글은 인공지능 관련 수십조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한다.



IT의 전방위적 융합, 청년창업에 파고들어야

대한민국 역시 IT 벤쳐 관련하여 매우 좋은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분명히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창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금융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도입되는 것처럼 대학생 몇명이 모여 인공지능을 간단히 응용하여 네이버 지식인과 같이 답이 나오는 만물박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에 기초한, 그러면서도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창업이 있을 것이다.

남궁단아 : 나 역시 IT 기술이야말로 청년 창업에 있어 가장 유망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C 언어를 이용해서 스마트 폰에 적용되는 앱을 개발하는 것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매우 좋은 부가가치산업이다.



앱이 빠진 스마트폰, 재진거나 매한가지

나 자신도 C 언어를 공부했었지만 무척 어렵다. 그래서 구글 기술진을 보면 거의 신과 같이 느낀다. 특히 알파고를 개발한 것은 정말 신기하다고 느낀다. 어쨌든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므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것은 청년창업에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정시찬 : 청년창업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콜 버스, 중고 자동차 경매 업체 등 상당 수의 청년 창업자들이 미비한 행정 지원, 반시장적인 행정 규제에 가로막혀 창업을 포기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제아무리 창의력 있고 뛰어나도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아이디어를 강탈당하기 십상이다. 반드시 한국의 시장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청년창업을 이루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경환 : 청년창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하려 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다.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재정 : 모두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창업이 현실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각종 신기술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더불어 가능한 한 정부의 규제를 해소할 수 있게 하여 최대한 각자도생(各自圖生)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로 토론을 정리 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승현(고려대 경제 3) :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내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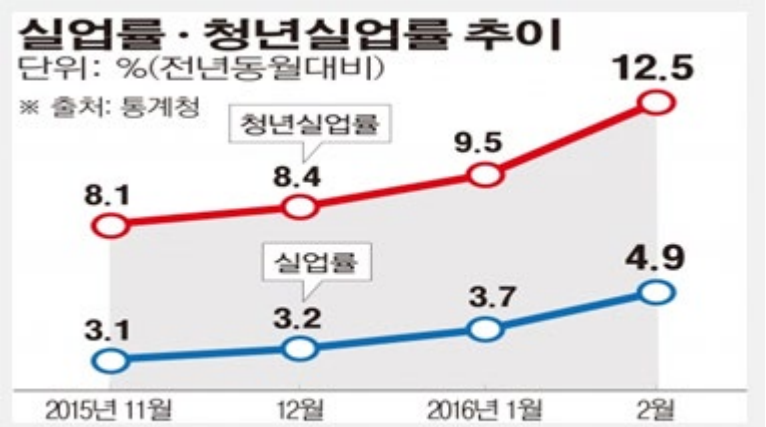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지원(고려대 경제 3) : 저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는 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을 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창업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필요했던 규제들이 현재는 창업 과정에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맞게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연(고려대 영문 2)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데 비해 이들이 목표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의 지속적 증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먼저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진수(고려대 미디어 3) : 저는 청년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세계 경제의 미래가 점차 불확실해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개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대기업 유보금을 이용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찾으려고 모인 청년들

조유정(고려대 경영 3)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만 집중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다른 여러 지원책을 현실에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고용률 자체만을 높이려고 하는 대신, 고용 구조를 건실하게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대책은 경기를 회복시켜서 여러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승현(고려대 경제 3) : 대한민국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한 가운데, 우리는 여러 문제들 중 청년실업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1: 재정경제부
2: 연합뉴스
3: 이투데이
4: 헤럴드경제 DB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위기의 상황!

이주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 1 차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연구모임에 참가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관한 제 100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잠재성장률이 2~3%대인 저성장 국면 진입하였습니다. 저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진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월례토론회에서는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로 정치의 실패를 들었습니다.



위기의 빠진 한국, 정치권의 잘못이 큰 원인 중 하나!

구체적으로는 포퓰리즘이 만연하여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고, 또한 대통령 단임제라는 제도가 정권에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한국이 휘청거리고 있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포퓰리즘을 막을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중임제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번 토론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는 바뀌어야 하는가? 그리고 포퓰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을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한(고려대 화생공 2) : 우선 저는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임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중임제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은 중임에 성공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중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까요? 연속적으로 당선되기 위해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방안을 토의 중인데, 오히려 중임제를 통해서 포퓰리즘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승태(고려대 화생공 4) : 저는 중임제가 꼭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임제나 중임제나 포퓰리즘이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포퓰리즘이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민의식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중임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안정성이 부족한 대통령 단임제

단임제의 폐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임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임기 5 년을 살펴보면 처음 1~2 년에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3~4 년 째 들어서는 '과연 이게 5 년안에 해결될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엔 레임덕이 오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정권교체에 시간이 걸리고 레임덕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게다가 단임제일 때 보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보이는 단임제는 국민들에게 '공수래공수거'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어차피 뽑아도 안된다는 인식을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임제로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민재(고려대 화생공 3) : 저 또한 중임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임제를 하되, 한 번의 임기가 5 년보다 적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못할 경우 빨리 빨리 교체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기가 짧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 투표할 것입니다.

박병선(고려대 식품자원경제 4) :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독재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로 인해 연임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독재와 연임은 다릅니다. 시민이 원치 않더라도 정치하는 것이 독재이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계속 집권하는 것은 연임이라고 합니다.


독재에 가만히 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다

독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지금 상황에서는 독재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독재를 한다면 전세계적 지탄을 받을 것이고 야당의 비판이 잇따를 것입니다. 아베나 대처나 루즈벨트는 연임을 함으로써 국가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처의 경우 12 년 동안 집권하면서 나라를 고쳤습니다. 연임을 해야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주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이제는 연임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987 년 개헌을 하면서 연임제를 해야하는가 단임제를 해야 하는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 군부세력의 독재로 인해, 독재의 폐단을 깨닫은 국민들이 단임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87 년으로부터 거의 30 년이 지난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독재를 걱정할 만큼 후진적인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박병선 학우가 발언한 것처럼, 독재가 이루어진다면 전세계적인 규탄은 물론 온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법안 하나에도 들고 일어서는 국민들이 독재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추세는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2014 년 10 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8%의 국민들이 4 년 중임제를 원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잘 들었습니다. 포퓰리즘과 독재가 행해질 우려가 있지만 이것들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임제를 통해 단임제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황승태(고려대 화생공 4): 우선, 용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의 경우 여러 가지 뜻이 있으므로 인기영합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권자들에게 표를 받아내기 위해서 단기적인 성과만을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직접민주주의 형태가 아닌 간접민주주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포퓰리즘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한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의 개선은 심의민주주의를 통해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들이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종합하고 절충하여 안건을 토의하는 것을 심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적 제안의 경우 이러한 심의 기구나 단체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선(고려대 식품자원경제 4) :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 포퓰리즘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경각심을 갖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심의민주주의처럼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세운다면 적극적으로 낙선운동을 벌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포퓰리스트다!' 라고낙인을 찍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세웠을 경우 사후 처벌, 명예박탈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포퓰리즘의 폐해를 막기 위해 '페이고(PAY-GO)'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을 먼저 집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아무데서나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미리 만들어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페이고 법안입니다. 먼저내고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페이고 법안을 통해 최소한 재정이 파탄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다한(고려대 화생공 2) : 심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식을 키우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치인 또한 스스로 포퓰리즘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승태(고려대 화생공 4) :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시민들의 각성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각성 또한 필요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민재(고려대 화생공 4) : 포퓰리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되었는데 정작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포퓰리즘 적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약을 내세웠을 때 공약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예산 재원이 현실적인지 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 정책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승태(고려대 화생공 4) :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동감합니다. 공약 이행률을 점검하여 중간에 자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만 내걸어야지, 무책임하게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고는, 정작 당선되고나서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제한이 걸려야하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합니다. 전두환의 경우 대통령직이 박탈되었는데, 이러한 식으로 명예 같은 부분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주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포퓰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심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식을 개선시켜 포퓰리즘을 해결하자는 제안과 정치인들의 각성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는 제안 그리고 내세운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는 제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늘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생각과 포퓰리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서 의미있는 주장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토론자들께 감사하며 이것으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③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흔들리는 한국경제, 정치 및 경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한슬(정외 3): 안녕하십니까?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와 국내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은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며 소를 잃었음에도 외양관을 고칠 생각을 못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흔들리는 한국경제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경제개혁뿐 아니라 정치개혁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과 자유롭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김지수(사학 2): 저는 특히 현진권 원장님의 "경제정책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일반인들이 상식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나, 정치권은 경제정책을 일반국민들의 투표행위와 연계하고 있다"는 말이 가장 공감되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소위 포퓰리즘이 만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방주현(정외 2): 최근에 그 비슷한 예로 총선 다가오니까, 높아진 2~30 대 투표율로 인해 2030 표심을 위해 갑자기 청년관련 공약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을 보호해주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선거에 닥쳐서가 아니라 평소에 입법해야 합니다. 선심성 입법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꾸준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주거문제가 대학생들에게는 큰 고민입니다. 최근에 소득은 떨어지고 있는데 주거비가 26.6%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반지하, 술집 2 층, 고시텔, 컨테이너 등에서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참여하여야 한다.

조재환(경제 2): 저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구 재획정 이후 지역구 의석이 증가되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 수가 감소한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다윤(정외 2): 특히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실패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만병통치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성장해야 한다.

김지수(사학 2): 솔직히 우리나라는 '경제'라고 하면 쉽게 '삼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지?"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라는 자본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도 경제침체로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기업 자체의 혁신은 부족한데 정부에서는 대기업 살리기를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서민들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조금 더 키워야 할 것입니다.

방주현(정외 3):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수당을 주는 것과 같은 정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1 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경력을 쌓기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요?

김지수(사학 2): 그리고 1 년 갔다 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1 년 갔다 와서 돈 받고 나는 대기업에 가겠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든 결국 목표는 대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은 실효성이 없고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주현(정외 2): 저도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조세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누진세를 통해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분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사학 2): 그리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힘듭니다. 대기업이 경제뿐 아니라 언론,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의 자리가 줄어듭니다.

방주현(정외 2):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가에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데, 대형마트 강제휴무와 같은 정책은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김한슬(정외 3): 맞습니다. 대기업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상향평준화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CSR 에서 CSV 로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은 역량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도 글로벌리제이션에 발맞추어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과도 협업체계를 형성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협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국내 대기업과 연계하여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이미지가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하나의 건실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조재환(경제 2): 저는 SSM 과 재래시장의 경우 두 개가 같은 지역에 동시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SSM 이 지어지기 전에, 그곳 재래시장과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없이 일단 지어놓고, 상생을 하라고 하니 상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가 있는데, 홈플러스는 첫째, 셋째 주에 휴무를 하고, 이마트는 둘째, 넷째 주에 휴무를 해서 강제휴무제도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포퓰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김한슬(정외 3): 실효성있는 경제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저는 포퓰리즘적 정책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세우고 표를 의식하는 것이 물론 나쁜 것이지만, 그들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표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각성을 요구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들이 조금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을 표로 벌하고 진실성 있는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에게 표를 줘야 합니다.

조재환(경제 2):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투표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의 투표가 반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표로 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거구 개편도 한 사람의 표의 가치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이처럼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선거방식처럼 득표율이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개편되어야 합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라 사표가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한슬(정외 3): 저도 조재환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실망'으로 인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투표를 해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 자신의 표는 사표일 뿐이라는 생각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하지 않으니까 더 안바뀌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보도를 위한 언론의 노력도 중요하다.

방주현(정외 2):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을 넘어 혐오를 느끼는 것에, 언론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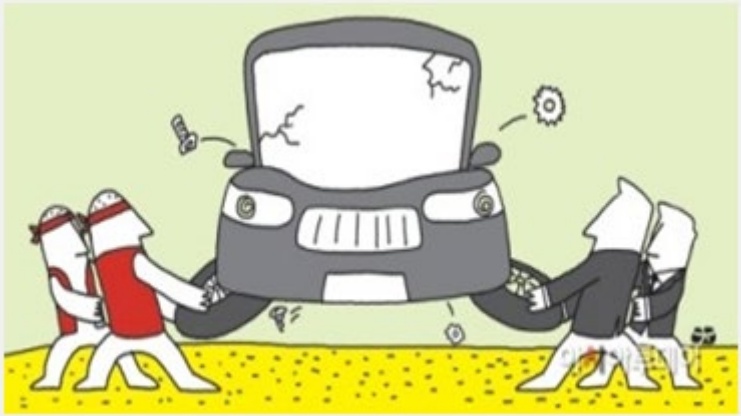
신문이나 뉴스, SNS 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 전문적인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언론에서 지나치게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양날의 검처럼요. 언론에서 잘잘못을 공정하게 모두 보도하여 그 심판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슬(정외 3): 여러분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 경제 개혁방안이 여러 가지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좀 더 전문적인 입법을 위해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포퓰리즘성 정책을 없애기 위해 국민들이 투표로 신상필벌을 해야 하며 독일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여 사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경제 개혁방안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누진세 실시, 대기업의 사고 변화, 중소기업의 역량 개발 및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thescoop.co.kr
3: peoplepower21.org
5: nomadist.org



노동시장 유연화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형원 (연세대 식영4):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은 심각합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4~50대 해고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해서 소득이 적어 생활이 고통스러운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높은 임금과 고용보장, 세습까지 보장되는 신의 직장도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 또한 어렵기만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적이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고용 안정성을 해쳐 노동자의 삶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노사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이번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간의 합의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만의 정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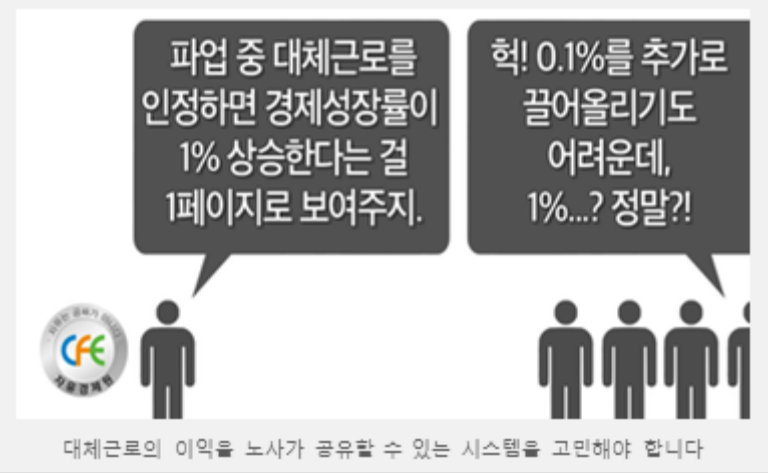
노사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정성일 (한국산업기술대 컴공 4): 저는 대체근로와 파견근로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근로를 실시할 경우 파업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자가 "대체근로할 사람 많으니까 영원히 파업할테면 해" 라고 말한다면 노동자는 대항할 카드를 잃고 약자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파견근로는 안 그래도 많은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조형원 (연세대 식영 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으면 파업시 기업들이 입는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손해를 줄일 해결책은 없을까요?

정성일 (한국산업기술대 컴공 4): 에초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일 등의 선진국은 노사분규시 중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어 파업을 하는 경우가 그만큼 적습니다. 한국도 노동자와 고용자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노동 판사가 갈등을 중재하고 지역주민, 대중 등의 제 3 자가 배심원을 맡아 노사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지원 (한신대 중국어문화 4): 대체근로 도입에 따른 이익을 노사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대체근로 투입 결정시 파업 노동자에게도 절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파업시 고용자는 인건비가 늘어나고 노동자는 임금이 줄어드므로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대체근로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기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준범 (광운대 전자재료 4): 기업마다 사정이 달라서 때로는 파견근로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 휴가 등으로 장기간 결원이 생기거나 생산량을 한시적으로만 늘리는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파견근로를 허용하되, 파견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높은 세금을 메겨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파견근로 비율을 조절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석 (서울과기대 IT 전자미디어 2): 모든 고용시장을 자율화하되 직원을 착취하는 나쁜 기업은 세금을 왕창 메기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으로 징벌을 하는 한편 복지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조형원 (연세대 식영 4): 나쁜 기업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금을 늘리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 속에서 세금을 함부로 인상하면 기업이 외국으로 도망가서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박준석 (서울과기대 IT 전자미디어 2): 노동시장 유연화가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경우 생기는 이익은 자본가만 가져가고 노동자는 얻는 것 없이 고단해질

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이익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송준범 (광운대 전자재료 4): 사실 노동자간의 양극화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족노조와 자본가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정착되고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어 비정규직이 해고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다시 구하고 동등한 대우와 임금을 받게 된다면 많은 불만과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병탁 (서울대 의용생체공학 1): 노사 간의 대화와 협상의 문화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선진국들은 정규교육 시간에 노사 합의에 대해 배우고 실습합니다. 노동자와 고용자 모두가 상대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협상으로 이익을 얻는 방법을 추구하도록 고등학교 시절 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노동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지은 (국민대 전자공학 3): 저는 사실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경기, 기계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개별 기업을 탓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김재윤 (한양대 경제 2): 동감합니다. 사실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지금의 많은 노동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창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를 고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송준범 (광운대 전자재료 4): 맞습니다. 앞으로 산업은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사라질 것이고 따라서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정규직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단어가 될 지도 모릅니다. 신기술을 배우고 신산업에 취직하고, 시간이 지나 신산업이 몰락하면 해고된 뒤 다시 신기술을 배워 또다른 신산업에 취직하는 순환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사회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정성일 (한국산업기술대 컴공 4): 그렇다면 개개인의 노동자가 산업이 해체되어 해고된 뒤 신기술을 습득할 때까지의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부의 분배, 재교육과 실업급여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노동구조 사회는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형원 (연세대 식영 4): 오늘 참색해주신 여러분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필수적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사회적 이익을 골고루 분배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토론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와 고용자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변화에 앞서 국민 전체의 토론과 설득 과정을 거치고 피해받는 구성원에게 공동체가 충분히 보상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구조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 1 회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1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201010000045
사진2 출처: 방승배기자 bsb@munhwa.com
사진 3 출처: 자유경제원
사진 4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60119140253808

④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한국 경제는 청년 실업 문제로 터널 속을 걷고 있다.

김주영 (명지대 국문) :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셔서 바쁘신 와중에 토론에 참석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고 손꼽히는 문제가 바로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지난 달 청년실업률이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9 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 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 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만 6 천명 증가했습니다.

청년실업률과 더불어 공무원 응시자 수도 늘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현실 속에서 안정의 방안으로 공무원을 찾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더불어 취업을 위한 스펙 경쟁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김민수 (광운대 경영 2) : 현대자동차 노조 등의 사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법을 악용해서 자기들이 물러나지 않고 기득권을 쥐고 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청년 실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헬조선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청년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단기적인 노력만 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이것을 하니까 나도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을 안하면 스스로 불안해하는 등의 태도 때문에 취직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양한 시선을 갖고 '다른 사람은 이런 걸 하지만 나는 다른 분야가 맞으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신수진 (서울시립대 국어국문 3) :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임금 얘기도 나왔는데, 베이비 붐 세대들이 퇴직을 앞두고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 인원이 많은 만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산업들이 포화되어있어서 창업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층의 인식에서도 창업을 떠올리면 어렵고 힘들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또 실패했을 때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혁신을 꿈꾸기 보다는 취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취업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창업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안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

윤성식 (광운대 경영 2) : 2000 년대 초반 대학진학률이 8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대학에 가는 이유 자체도 뚜렷하지 않고 남들이 다 가니까 간다는 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대학은 진리 탐구보다는 직업 교육의 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근거로 대학을 평가하다보니 더 문제가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을 장려하기 보다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취업교육을 강화해서 특성화고교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4 년대 종합대학보다 전문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전문대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청년실업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명지대 국문)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봤습니다. 현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도움과 함께 청년들의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 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92386
그림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68&aid=0000113305

⑤ 영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한국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김주헌(영남대 국사 4) : 지금부터 영남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관한 제 100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 상황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와 국내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의 경우 자영업 분야의 과포화 상태와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해결방안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우선은 내부의 문제점들을 짚어가면서 내수시장의 기반을 탄탄히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진적인 개혁에 있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내수시장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수목(영남대 정치외교 2) : 저는 내수시장의 활성화는 대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어느정도 노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혁을 통해 기업이 해외로 나갈 경쟁력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족노조,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하용대(영남대 정치외교 3) : 내수시장의 부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외부로의 확장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내수시장이 발달해있는 곳입니다.

이익대비 노동비를 생각했을때 노동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에 의한 내수시장의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귀족노조의 키워드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귀족노조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선을 환기시켜려 한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노조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려고 하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수목(영남대 정치외교 2) :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회사와의 상생을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족노조가 파업을 일으킬 경우 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방해가 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소비층이 있어야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신동혁(영남대 역사 2) : 너무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도 문제라고 보기에 중소기업에게도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주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층이 있어야 건강한 내수시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용대(영남대 정치외교 3) :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대기업우선정책으로 경제를 부흥시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나, 대기업은 여전히 국가에서의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기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악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내수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태희(영남대 정치외교 2) : 저도 동감합니다. 대기업만 좋아라고 혁신하는 것은 현시대의 상황과는 맞지않다고 봅니다. 글로벌 기업이 된 상황에서도 트리클다운 효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혜택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전에 나온 콜버스 앱이 택시업체에 의해 규제에 묶여있다가 최근 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조경제를 이루어가려면 규제에 대한 철폐가 완화되어야 창업적인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혁(영남대 역사 2) : 창업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어느정도 규제가 완화되어야 성장동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노조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노조가 운동권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받을 것은 받고 줄 건 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방식으로 강경한 모습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김주헌(영남대 국사 4) : 노조의 개혁을 통해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내전반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의견이 맞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족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있어 고용주에게도 큰 피해가 입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야 국내의 경제가 안정되어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의 비중이 적다는 점과 다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우리나라 가점진적인 개혁을 한다면 모두가 상생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하여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발돋움을 할 기반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사진 2 : 이투데이
사진 3 : 패션채널

⑥ 경상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김효원(경상대 건축공 4) : 지금부터 경상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청년 실업 문제, 수출의 정체내지 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청년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이솔미(경상대 건축공 4) :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노동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신입채용이 갈수록 줄어들고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국내 중소기업 취업과 해외취업도 모색해야합니다.

강효빈(경상대 건축공 4) :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만 선호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기업 취업을 시도하다 실패하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고 대기업취업만이 정답이 아닌데 대기업을 고집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취업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대기업만 고집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길도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설명회나 실습 기회를 늘려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심창현(경상대 건축공 4) :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취업의 길도 모색해봐야 합니다.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국내 취업에 실패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취업에 성공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젊은이를 봤는데요. 이처럼 글로벌시대가 도래한 만큼 국내에만 취업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삼아야 합니다

.

해외취업을 막막해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정부에서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망을 구축해준다면 해외취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수연(경상대 건축공 4) : 저도 국내취업만 고집하지 말고 해외취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이직 횟수는 3 회 정도인데 이직을 고려한다면 첫 직장이 평생직장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면 안됩니다. 취업도 단계별로 공략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직장에서 배우고 실력을 키워 경력을 쌓고 난 다음 한 단계 높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전략도 생각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해외취업 모두 고려해 취업의 폭을 넓혀야 하고, 단계적 성장과 이직을 통한 취업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해외 일자리 정보안전망 구축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창현(경상대 건축공 4) : 국내의 경우 취업 후에도 기업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그동안 뉴스나 기사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무한 경쟁에 지친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바라고 공무원을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 위가 공무원이 된 현실에서 상황을 전환하려면 기업의 문화가 선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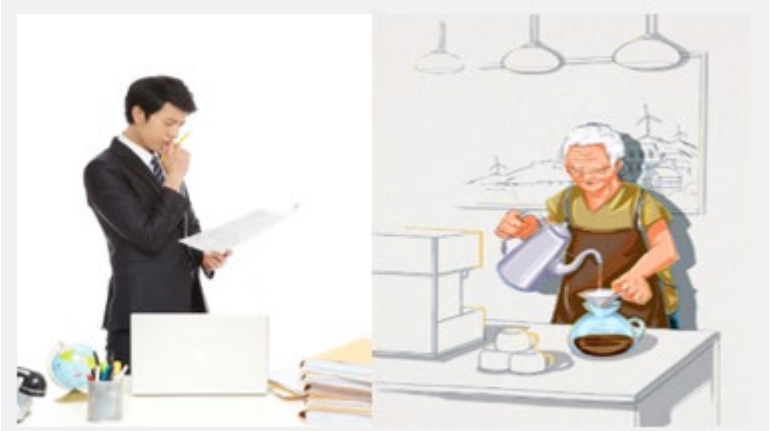
계속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공무원을 준비한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경제 위기를 벗어 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선진적 기업 문화의 확산을 통해 벤처기업도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연(경상대 건축공 3) : 선진 기업 문화 형성에는 동의하지만, 기업 내의 경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직원들의 노력과 성장을 통해 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는 자연스레 도태되고 역량을 키우고 노력하는 자가 승진하는 것은 약육강식의 냉정한 경쟁시대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기업의 선진적 문화를 형성하려면 복지제도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업에서 육아휴직이 있어도 눈치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임수연(경상대 건축공 4) : 국내 기업의 정보 공개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업 채용 시 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재에 대한 요구조건과 능력,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채용결과에 따른 탈락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채용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탈락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보완할 수 있어 취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김효원(경상대 건축공 4) : 임금피크제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청년들의 고용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중장년층의 실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세대와 저희와의 문제입니다. 중장년층이 퇴직하고 앞으로 40~50 년 남은 삶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재취업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령시대를 넘어 초고령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노인들의 노동력이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솔미(경상대 건축공 4) : 저도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업은 신입채용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것이 실무능력입니다. 따라서 취준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기업과 대학이 결합하여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대학을 운영한다면 취준생들에게 실무교육을 시켜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의 많은 경력을 활용해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효원(경상대 건축공 4) : 여러분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 해외취업에 대해 쉽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취업 정보 안전망 구축 방안, 기업의 채용 정보 공개 투명화 방안, 선진 기업문화 정착과 복지제도 확충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이 협업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 기업대학 활성화를 통한 청년의 고용창출과 중장년층의 교육자로서 재취업 방안 등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선진적 기업 문화 형성, 복지제도 확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⑦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정학(서강대 컴퓨터공학과 1) : 지금부터 서강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업으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중국과 일본의 경제 악화가 겹치고 있고 저유가로 인해 산유국들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지 8 년여가 되어 가는데도 세계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경제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분야는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사상 초유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이 상당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의 정체 내지 감소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를 이끌고 나가야할 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활성화 해야

이에 우리 서강대학교 학생들도 한국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제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정금성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우리나라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대기업의 아웃소싱을 중소기업으로 이전시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보호법을 잘 지지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높여야

황제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우리나라 제조 품목들의 다양화를 통해 과거의 반도체나 선박과 같은 한정된 품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영미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제조기업들의 현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4.0 과 같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질의 향상과 설비의 IT 화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목표와 그를 이루기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금융 제도를 혁신하여 R&D 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투자 할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금융 정책을 재정비 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 아이디어들을 특허를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가 R&D 지원해야

채송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키워야 합니다.

오정학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울산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서 들어보니 일자리문제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은정(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내 친구도 울산에서 일하는데 임금차가 너무 커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임금차가 2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한 것 만큼 받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미(서강대학교 중국어학과):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를 나누기를 실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실례로 현대 자동차노조는 법정 주 40 시간 에서 시간을 늘려 주 60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를 독식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없애고 노조들이 법정 시간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족들과 문화 생활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해야

황제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조업에 필요한 유능한 기술인재들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학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다른 나라들과 FTA 를 많이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부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경제 영토를 넓혀 제조업뿐만 아니라 경제가 많이 성장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송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FTA 를 많이 체결하면 피해를 보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조업도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우세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업종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박영미(서강대학교 중국어학과): 요즘은 세계화 시대라 우리가 어떻게든 경쟁력을 높여 살아 남아야지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는 더욱더 글로벌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과 FTA 체결해야

오정학 (서강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뉴스에서 보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쌓아둔 기업 유보금이 수백조 원에 달한 다는데 그 돈을 투자할 수 있게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낮추어주고 쌓아두는 기업에는 많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송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기업들도 불안정하니까 투자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개입하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될것이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정학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현대화 ,R&D ,일자리 개혁, FTA 체결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흔들리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독일처럼 산업혁명 4.0 을 국책사업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품목의 다양화를 통해 국제 시장의 구석구석을 한국산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나라들과 FTA 를 체결하여 우리의 시장을 전 세계로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을 많이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토론한 제조업 활성화 방안들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셔야 한국경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⑧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바라본 정년연장

이재환(동아대 무역 2): 2 월 월례토론회에서는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늘어가는 노인인구를 바라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는 시점에서 '정년 연장 옳은가'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년 연장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바야흐로 평균수명 100 세 시대가 멀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의 정년은 남은 생을 여유롭게 살아가기에 무리가 많아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들 하나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임금 대비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 또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혜림(동아대 무역 2): 저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고령 근로자들은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은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들은 젊은 근로자들에 비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미(동아대 무역 2): 저는 정년 연장에 찬성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면 노인 부양 문제가 국가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노인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해야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노동력 부족이나 노인부양 문제 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진(동아대 무역 3): 전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정년 연장의 반대에 가장 큰 근거는 청년실업률인데 정년 연장과 청년실업률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주요 정책들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년의 연장은 악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공지능의 발달은 이후 일자리 감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많은 견해가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들의 정년 연장은 청년 실업률을 더욱더 올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년 연장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최희정(동아대 무역 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퇴직 시기와 연금 수령 시기 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연히 그 기간 동안 중장년층은 경제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중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12 년 짧은 근로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량은 방대합니다. 많은 일을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 삶의 질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가나 휴식을 즐길 시간보다는 일에 쏟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경우 1 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이윤창출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으로 정년을 설정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재환(동아대 무역 2): 네, 토론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의 부작용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남진(동아대 무역 3):저는 앞서 말한 대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인들의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면 정년 연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도 노사갈등을 피할 수 있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형미(동아대 무역 2):저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구조가 옛날과 크게 바뀐 지금, 노인들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인 직업 상담소 같은 시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림(동아대 무역 2):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질적인 부분에서의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 교육적인 부분에서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환(동아대 무역 2): 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 또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고령화사회에서의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⑨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글로벌경제와 한국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다.

정승훈(단국대 철학 4) : 최근 글로벌 경제와 국내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자영업 분야의 과포화상태에 사상초유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도 상당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의 정체내지 감소문제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은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국회에서 법안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어 이제 위기 대응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힘듭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단국대 내에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해 **"한국식 단임제, 단원제가 옳은가, 미국식 중임제, 양원제로 가야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자는 11 명, 사회자는 저 한명으로 총 12 명이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이상목(단국대 사학 4) : 단원제가 양원제로 바뀌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제도가 바뀐다고 개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양원제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가 양원제로 가면 상,하원이 수직적인 권력계층구조를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수평적구조보다 수직적구조가 익숙한 나라인데 이러다 보면 의사결정과정이 지루해져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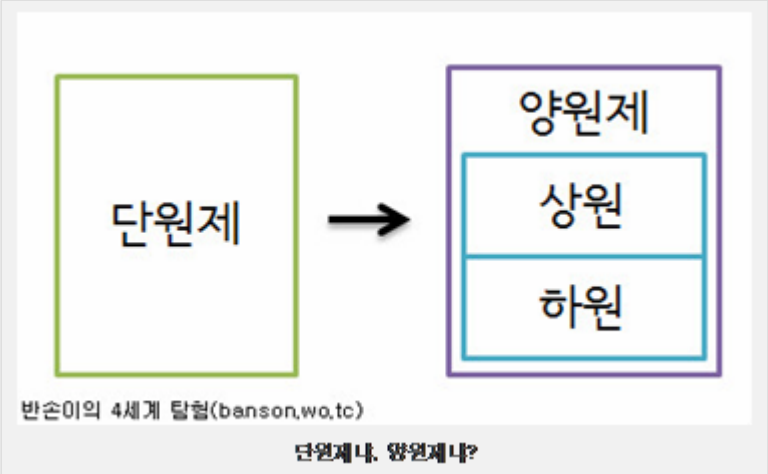
허슬람(단국대 철학 3) : 양원제와 중임제가 패키지로 묶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중임제는 찬성하지만 양원제에 반대합니다. 정치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원제는 법안통과가 어렵고 비효율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체제로써, 행정부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양원제로 가면 이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양원제를 택한 이유는 상원이 주의 대표자(지자체장), 하원은 우리나라식으로 뽑는건데, 미국은 연방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자체장이 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역당의 색채가 짙고 또 미국에서 상, 하원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주와 당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하원이 나뉘어질 경우 한 당의 성격이 의회에 더욱 짙게 깔릴 수 있기 때문에 양원제에 반대합니다.

중임제는 찬성하는데, 5 년 임기는 너무 짧습니다. 2 년 정도가 행정부의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이고 또한 초기 1 년은 학습하는데 소모되고 나머지 1~2 년은 레임덕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장기적

정책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5 년 임기로는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키지로 묶자면 단원제, 단임제를 지지합니다.



정민우(단국대 경영 3) : 저의 의견은, 중임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중임제는 노태우 정권때 5 년 단임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이전보다 성숙되었기 때문에 능력 있고 신임받는 대통령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프로젝트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5 년 단임제는 전 대통령이 추진해오던 사업을 새 행정부가 버리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임제를 실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대통령을 4 년으로 하면 국회의원도 4 년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원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양원제는 의회가 상하원 합의체로 구성되고 상하원 합의가 된 사안에 있어서만 의결사항으로 인정이 됩니다. 의회의 신중을 가하는 체제로서 신중하게 입법을 할 수 있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잘 수호하는 체제인 장점이 있으나, 양원제는 의결과정에 시간이 더욱 많이 걸리고 이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또한 정당에 문책을 할 때 상하원으로 나뉘게되면 그 책임을 묻기에 애매해집니다. 또한 앞의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는 의회가 됩니다.

김선교(단국대 철학 4) : 궁극적으로는 중임제 양원제로 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양원제의 단점을 커버할만한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양원제를 위해 지방자치제도의 선거를 보완하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양원제라는게 권력분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정부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양원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임제로 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4 년이 지난 후 총선이 있으면 심판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사회적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선거구 획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재(단국대 정치외교 3) : 5 년이 아닌 6 년의 단임제가 어떨까 합니다. 현행 대통령제에서 1~2 년은 학습 기간 마지막 2 년 정도는 레임덕. 그래서 6 년을 주장합니다. 지방자치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동시성을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선거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차를 두고 보면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단원제를 유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행정부의 권한이 워낙 막중합니다. 의회가 이를 견제해야. 단원제의 장점을 이용해서 빠른 법안처리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 종염제냐 단염제냐?

김선교(단국대 철학 4) : 양원제가 시간 비용측면에서 더 많이 소모된다는 점은 맞지만, 필리버스터를 보다보면 국회 임기 4 년 동안 법안통과를 안시키다가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를 시키다보니 법안의 세부적인 검토가 많이 안됩니다. 그런면에서 단원제가 시간 비용 측면에서 반드시 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유리하다 하더라도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현중(단국대 법학 4) : 단원제를 찬성합니다.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의 상황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영화 〈링컨〉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 폐지 법안통과를 위해 야당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파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양원제를 실시한다면 상원은 여당 하원은 야당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생깁니다.

중임제는 정치개혁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8 년 이후에 더 이상 출마를 안하기 때문에 부시는 조기 레임덕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면 그것이 다음 행정부에서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대강 사업이 정말 좋은 정책이었다면 그것이 이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효율성vs효과성

박태윤(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 4) : 문제의 핵심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양원은 공간을 2 개를 갖게 됩니다. 공간이 2 개가 생기면 정책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법안 진행의 속도를 볼 때 단임제가 양원제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볼 때 허가를 빨리 받아낼수록 책임자를 유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입법의 기능에서도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임제는 대통령을 투표논리에 귀속시킵니다. 그러므로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동욱(단국대 경영 4) : 저는 연임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때부터 연임제의 문제를 많이 보여줘서 노태우 정권때 5 년으로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연임이 가능하면 대통령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원제를 해서 상원에 젊은 국회의원을 많이 끌어모아 개혁을 단행하면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윤호(단국대 전자전기 4) :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파주의와 계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단원제와 양원제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원제를 하면 당파주의의 색채를 희석시킬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지만, 양원제는 정치의 내용과 형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원(단국대 한문교육 4) : 단원제는 빠르고 신속한 처리가 장점입니다. 하지만 경솔한 법안이 날치기식으로 통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양원제의 장점을 살려 상원이 하원을 감시 감독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더한다면 더 좋은 법안이 통과되어 법안 통과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원제 체제 하에서는 또한 대통령의 힘이 너무 막강합니다. 하지만 양원제는 대통령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교(단국대 철학 4) : 효율성의 논리만이 국회 운영의 논리는 아닙니다. 법안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빨리 통과되는게 경제적인 게 아니라 효과적인 법안이 통과되는게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우(단국대 경영 3) : 우리나라는 당파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서 괜찮은 정책이라도 중장기적으로 해나가기가 힘듭니다. 법안통과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단원제가 더 효율적입니다. 상 하원으로 나뉘어지면 신중해 진다기보다 분쟁만 더 불러일으키고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허슬람(단국대 철학 3) : 대통령이 입김을 불어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아까 빠르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 섬세한 처리를 거쳐야 할 법안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국가로서 빠른 법처리가 가능해야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윤호(단국대 전자전기 4) : 양원제의 경우 대통령의 입김을 덜 받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허슬람(단국대 철학 3) : 양원제의 경우 분열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민우(단국대 경영 3) : 양원제의 경우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됐다기 보다는 행정부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무능력한 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임제	중임제
단원제	이상목	허슬람, 정민우
양원제	이호재	김지원, 김선교...(등등)

김지원(단국대 한문교육 4) : 양원제에서 상원은 간접선거로 선출된 전문가 기관입니다. 상원의 경우 고문 내지는 원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죠. 당파정략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날치기식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없애줍니다. 따라서 양원제가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시 감독을 통해 의결기관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주형(단국대 정치외교 3) : 효율성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정치의 본질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정치는 경제와 다릅니다. 또한 정치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양원제와 중임제에 앞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를 바꿔야 합니다. 뿌리가 되는 투표를 바꿔야 그 위의 정치체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선교(단국대 철학 4) : 효율성도 정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는게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지자체장들이 자기 구역의 권익을 위해 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는 제도가 선행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중(단국대 법학 4) : (이주형의 문제인식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근본만 붙잡고 있으면 문제해결이 안됩니다. 그 뿌리 위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승훈(단국대 철학 4) : 이로써 토론에 참여한 11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역시 다양한 학과에서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단임제와 중임제, 단원제와 양원제에 대해 참신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주신 것 같아 기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효율성”의 논리와 “효과성”의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문제점들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모두 많은 공부와 참신한 사례로 토론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신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제 1 차 단국대 선진화 연구모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⑩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경제는 경제 특유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주아람 (건국대 경제학 4): 지금부터 건국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연구모임에 참가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국과 유럽 및 선진국 경제의 부진과 더불어 나타난 저유가 기조에 따라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질적인 가계부채 문제와 부실기업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또 다시 위협적인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선 경제는 경제의 논리로, 정치는 정치의 논리로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투트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시장의 논리를 무시한 채 정치의 논리에 입각해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선거철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포퓰리즘 문제를 비롯한 경제의 정치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한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정치화의 대표적인 예, 포퓰리즘

김은서 (건국대 경제학 4) : 저는 경제의 정치화 현상을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단 정치인 개인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은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급속한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경제의 정치화 문제의 해결점 또한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것 보다는 경제를 정치에 편입시키고 표심을 자극하는 도구로써 사용하려는 정치인들의 개별적 자질들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가은 (건국대 경제학 4): 조금 생소한 시각이지만, 인구 규모의 관점에서도 경제의 정치화 현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이러한 경제의 정치화 같은 문제들이 더욱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포퓰리즘이 판칠 수 있게 된 것은 인구 규모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다면, 큰 인구 규모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 의견과 입지의 다양성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현명한 정책 입안자보다는 대중 인기 영합 주의자가 더 살아남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큰 인구 규모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치의 경제화가 가져다주는 악영향들이나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인구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포퓰리즘에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규모가 증가한다면 충격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민하 (건국대 경제 4) : 저 또한 앞서 말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 자질의 문제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포퓰리즘을 억제하기 위해선 이러한 대중 인기 영합꾼들을 가려내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책 사례는 옛 대선 주자였던 허경영씨의 정책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 시 남녀 각각에게 5000 만원씩 지급해준다는 것과 출산시 3000 만원을 준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공약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 조차도 현실성 없는 정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심성 정책들은 꿰뚫어보는 것이 쉽지만 오늘날 만연하는 대부분의 포퓰리즘 정책들은 특정 사상과 더 큰 인류 공동의 가치를 끌어와 내 것으로써 교묘하게 그것의 허구성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아람 (건국대 경제학 4): 그래서 제가 칼럼에서도 언급했듯, 어린 시절부터 포퓰리즘 정책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 복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며 어떤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역량들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백민희 (건국대 응용통계 4): 저는 경제의 정치화 현상 중 또 다뤄볼만한 것으로 이해집단에 의한 로비와 그로 인한 쏠림현상을 들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불공정한 뒷거래 등 압력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논리나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큰 편익이 돌아가는 법안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보호만을 고려한 입법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경제의 정치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시안적으로 자신만의 파이만을 좇는 게 아닌,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파이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아람 (건국대 경제 4):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의 정치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해보았는데요, 먼저 시스템이 아닌 개인적 자질의 문제이므로, 정치인 개인의 자질을 개선해야 하며, 인구 규모를 늘림으로써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제의 정치화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시민들 스스로가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이해집단에 의한 '쏠림 입법'도 포퓰리즘 정책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토론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화 과제 40: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제 105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여러분에게 자연은 어떤 존재 인가요?

세계사를 통해 보면 인문정신은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양의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의 인문 정신을 부활시켜 일어났고, 최근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는 IT 기술문화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인문학과 인문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문정신은 바로 '자연'속에 존재합니다. 한국의 고유사상에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이 있습니다. 하늘을 경외하고 대지를 숭배하며 그 사이에 살아가는 인간의 겸허함을 강조한 사상입니다. 우리의 인문정신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 선진화포럼은 지난 7 월 28 일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제 10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건축양식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어떠한 이론을 내세우고 그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적을 직접 돌아보면서 느끼는 감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중일은 각각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중국은 워낙 넓은 국토를 갖고 있어, 산과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게 자연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항상 지진의 공포가 그들의 주위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산과 들, 강, 바다가 한 눈에 들어와 건축양식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형성되었습니다. 단청, 한복, 한옥, 한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색감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유적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함께 모여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선율이 완성되듯, 자연을 통해 우리는 화합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명승에는 우리 선조들의 자연관이 담겨 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학범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는 자연은 인류문화를 가능하게 한 그릇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가 되어 문화를 발전시켜온 것이 곧 동양의 자연관, 한국인의 전통적인 자연관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중시해온 한국인의 전통은 우리 국토와 문명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자연 지세를 살펴 도읍을 정하는 등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이라는 동양의 우주론적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연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선조의 자연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 곳곳에 있는 명승을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 명승에 방문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룬 조성의 지혜와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한국인만의 자연을 느껴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은 어떤 관계일까요?

마지막 토론자 신숙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착한 선진화의 핵심적인 가치인 공존, 소통, 공유, 나눔과 베풂은 자연의 이곳저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자연이 어떤 존재이며 착한 선진화의 핵심가치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생명의 터전입니다. 자연은 어머니처럼 모든 존재를 보살피고 품어주며 공존과 공유, 나눔과 베풂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호연지기'의 기상을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술적, 창의적 영감을 자극하는 보고이자 우리의 심신을 순화시키는 치유의 손길이기도 하며,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연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착한 선진화'와 연결짓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율학습 제도를 자연체험 학습으로 활용하고, 과거의 농활을 자연체험활동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교육 속에 자연이 녹아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우리 조상의 지혜를 깨닫고 그 안에 담긴 인문정신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교육 속에 자연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의 한 학교의 경우, 학교 안에 나무를 심어 작은 정원을 만들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안에 정원과 화단을 가꾸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늘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연에 대한 학습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교과를 새로 신설하고, 일주일에 2 시간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한 시간은 교실에서 교사와 함께 이론수업을 진행하고, 한 시간은 직접 밖으로 나가 근교의 문화유적을 탐방하거나 학교 안에 마련된 정원을 함께 가꾸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자는 공익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문화유산 속에 녹아있는 위대한 자연관과 가르침을 3 분 분량의 짧은 영상에 담아내어 TV 프로그램 사이 광고시간에 방영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 속에 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피고 묵묵히 지켜준 것은 자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과 함께 해 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을 개척의 대상, 개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할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육 속에 자연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자연과 함께하는 착한선진화 운동을 전개하면 어떨까요?

② 윤다영(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부)


자연에서 배우는 정신문화를 통해 착한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과거동안 우리나라는 정신문화를 잊은 채 성장을 위해서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전쟁 시대에도 살아남아 선진국의 문턱에 발을 딛을 수 있었죠. 물질적 풍요는 누리고 있지만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은 정신문화를 부활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에 한국 선진화 포럼은 지난 7 월 28 일 오전 7 시 프레스 센터 20 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 실천방안' 이라는 주제로 제 105 차 월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착한 선진화를 이룩할 실천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발제자인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자연과의 공존이 중요하다며 과거 선조들이 자연과 함께한 문화유적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반만년의 역사 동안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인간은 살았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노력했고 자연 속에서 자아를 찾아 왔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을 도외시하여 경제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사회 갈등을 겪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문화유산으로부터 선조들이 자연과의 공존을 중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동양, 그 중에서도 한국은 자연과의 조화를 우선시 하였다."며 사대문(四大門), 궁궐과 종묘사직, 왕릉을 예로 들면서 문화 유적 속에서의 실천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인류가 지향할 방향을 사색할 때 한국의 정신문화에 깃든 화합과 소통의 정신, 인본주의, 자연과의 조화, 나눔의 정신은 그 해답을 제시해준다." 며 특히 세계화 속에서 한국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자연의 가치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자연체험의 기회', '문화해설사 교육', '자연보호운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의 실행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연이 인간의 행복한 삶에 필수조건이라 강조하며 자연과의 '동행의 길'로서 상생의 실천을 역설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김학범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는 "숲 없이 문화 없고 문화 없이 숲 없다."고 역설하며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인문학이라는 실천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연과 인문학의 조화로 21 세기 국가 선진화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1세기에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연과의 공존, 조화를 최우선으로 두었기에 자연과 함께한 정신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나눔의 정신은 지금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한 이 시기에 되새겨야 할 가치이죠.

사회갈등이 고조된 현대 사회에서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한국의 전통 윤리는 더욱 중요해졌죠. 그렇다면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천방안이 있을까요?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항상 자연을 가까이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고 항상 사색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죠. 조선시대 선비들의 집 안에는 배롱나무가 참 많습니다. 신사임당의 친정이자 율곡 이이가 태어난 강릉의 오죽헌에는 대나무 못지않게 많은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선비들은 개인의 안위나 처자식 때문에 신념을 굽힐 유혹에 빠질 때 마당에 있는 배롱나무를 보며 마음을 되잡았다고 합니다. 곧고 담백한 배롱나무는 서원과 서당에도 많이 있어 자연과 함께 자신의 삶을 그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선비들은 배롱나무를 보며 사색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손 안의 휴대전화에만 빠져 삶에 대한 사색은커녕 자연을 되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30 분만이라도 도심 속의 자연으로 나가 사색하는 것을 착한 선진화의 첫 단계로 삼고 싶습니다.

사색과 명상이라 하면 방 안에서 혼자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 속에서 사색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옛 선비들처럼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다양한 가치를 곱씹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한국의 전통 윤리에 가장 크게 공감을 느낄 것입니다. 성장 속에서 잠시 잃어버렸던 인본주의를 자연과 함께하면서 다시 찾는 것은 어떨까요? 자연과의 조화에서 나오는 포용적 조화사상은 착한 선진화로 가는 포문을 틔워줄 것입니다.

③ 김지영(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21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 경제발전으로 인류사회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쳐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생활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유례없는 발전은 또 다른 그림자를 가지고 인류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의 발달로 초래되는 환경파괴와 휴머니즘을 상실한 비인간주의적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21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해 나갈까요?

이에 대해 한국선진화포럼은 7 월 28 일(목) 오전 7 시 프레스센터 20 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 실천방안'을 주제로 10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의식하고 바로잡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궁궐을 포함한 수 많은 한국의 문화유산은 인본주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 이배용 회장께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 속에서 착한 선진화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닦아온 길은 당대의 선진화 길이며 그 위에는 자연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당대 선조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조들의 문화유산에는 자연과 함께 하고 이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창의성과 상상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대문 이름에 있는 인,의,예,지,신은 자연과 함께 도덕적인 심성을 갖추려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궁궐에는 12 지신의 동물들의 조각상이 있는데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 월대 밑에 무릎을 탁 짚고 땅을 짚는 두 마리의 원숭이는 임금님도 지나가는 관리들도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해달라는 무언의 염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제 1 호로 등재된 유산인 영녕전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염원을 담고 있으며,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단과 직단에는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는 안보를 챙기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보여주는 조화정신을 본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화유산은 자연과 함께하면서 더 가슴 속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 회장님께서는 선진화는 앞서가는 것 속에 발전이 있지만 그와 함께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어길 수 없는 자연의 법칙과 호연지기의 정신등 자연이 주는 준엄함과 따뜻함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과 함께한 문화유산을 통해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의 정신을 함양하여 '착한' 선진화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글로벌화의 궁극적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신뢰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주는 준엄함과 따뜻함을 배워야 합니다.

토론자인 한경대 조경학과 김학범 교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착함과 순수함이라고 하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배움을 통해 우리가 자연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국가선진화의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문명사회를 거치면서 자연 개발, 자연 훼손이 극심해졌고 이에따라 다시 한 번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깨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선 자연은 인류문화를 가능하게 한 그릇이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간의 조화로운 관계와 자연의 착함과 순수함 그리고 자연의 순리를 배우는 것이야 말로 말로 우리가 취해야 할 21 세기의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과 역사와 문화로부터 우리는 배움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토론자인 서강대 신숙원 명예교수님께선 자연과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의 역사문화에 깃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소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 깃든 착한 선진화의 핵심 가치를 터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은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자 스승이고 창의력의 보고이며 동시에 대립과 분열을 화합으로 승화해주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연은 우리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착한 선진화로 연결하기 위해선 우선 자연체험의 기회와 학습을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가치를 배우려면 자연체험의 학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문화유산 유적지 탐방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깨닫고 다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이룰 수 있으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자연보호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는 '나 부터 시작하자' 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이상고온 현상이,중국은 며칠 전 18 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환경단체들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들의 노력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개개인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는 모두 물 절약, 에너지 아끼기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들에게 편리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합니다.

예시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모두 알지만 여름만 되면 전국 곳곳에 있는 해수욕장이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본인이 편하려고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연의 유한성을 알고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휴지나 일회용 젓가락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면 의지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일부러 의식을 하기도 전에 자연보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기업들의 환경보호 켐페인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스타벅스나 할리스와 같은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커피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사이즈를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다양한 혜택을 알고 계시나요?

이와 같이 현재 많은 대형 커피전문점은 커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켐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뿐만 아니라 백화점 화장품스토어에서도 화장품의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화장품 공병을 넘겨주면 샘플을 제공하는 등 작지만 의미깊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 할 수 있는 켐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포함한 수 많은 단체들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사회적인 유인책을 마련한다면, 우리 모두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환경보호켐페인이 마련되어 대자연과 공존하는 착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앞장서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④ 김지예(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문화 형성,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자연을 공포와 신비의 대상, 개발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형성 및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경제의 발전, 가장 크게는 산업혁명을 통해 자연 개발을 뛰어 넘어 파괴하는데 까지 이르렀고 우리가 자연을 잃어가는 만큼 세상 속에서의 휴머니즘도 사라져왔습니다.

현대과학기술 혁명이 초래한 이 같은 휴머니즘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선진화 포럼은 지난 7 월 28 일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10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IT시대 속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발제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용 원장은 세계사를 보면 인문정신은 항상 시대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언급,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또한 IT 기술 문화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인문정신을 강조했다고 말하며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인문정신을 한국 역사 속에서 찾는 지혜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며 항상 자연과 함께 했던 우리의 역사를 통해 인문정신을 배울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실천방안은 어떤 현란한 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닌 우리 문화유적을 돌아보며 느끼는 감동으로 출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토론자 신숙원 교수 또한 자연과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연의 가치를 이해하고 착한 선진화와를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체험의

기회와 학습을 제공하고, 심도 있는 역사문화 탐방의 기회를 만들고, 자연보호 운동을 해야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자연이 있었기에 문화가 존재할 수 있었다.

토론자인 김학범 교수는 "'숲 없이 문화 없고, 문화 없이 숲 없다.'는 오스트리아 삼림미학자의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서 숲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연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연이 곧 인류문화를 잉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정말 인류문화를 가능하게 한 그릇입니다."라고 하며 "자연의 순리 속에서의 배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21 세기의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연의 순리 속에서의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하여 현재에도 우리 문화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만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모든 것이 자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극기' 속에서도 자연을 배울 수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고, 가운데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네 모서리의 4 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가운데 건괘는 하늘을, 곤괘는 땅을, 감괘는 물을 이괘는 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 조상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함께하는 선진화를 실천하는 데에 있어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몸소 느끼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천방안으로는 역사책을 자녀에게 건네주기 전에 우선 역사에 흥미를 붙여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그 해답이 박물관 답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책만 보면서 배우는 것과 몸소 보고 느끼는 것에는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다면 역사에 흥미를 붙일 수 있고 나아가 자연과 함께 했던 조상의 삶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유적에 흥미를 갖고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박물관의 가치를, 즉 우리 역사의 가치를 높이 생각하도록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박물관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박물관 입장료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한국 돈으로 만 원에서 비싼 곳은 오만원이 넘는 곳도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왜 우리는 해외 박물관의 가치만을 높이 사는 걸까요?

하지만 해외에서의 박물관 답사에 우리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박물관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오만원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한국 박물관에 가라고 한다면요?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대부분의 박물관 입장료는 비싸지 않은 편이거나 무료입니다. 그럼에도 박물관을 찾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가치관을 변화시켜 외국에서만 비싼 돈을 내고 그들의 문화유적을 볼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우리 문화유적의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여 우리의 역사가 문화가 더 높이 평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물관 입장료를 무작정 올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강제적인 가격 상승이 아닌 우리 스스로 가치관 변화를 통한 입장료의 상승이라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더욱 찾아가고, 그 속에서 자연을 배우며 자연과 함께하는 선진화를 이룩해 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⑤ 김현경(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경제적 풍요 속에서 우리는 자연을 도외시하고 인성은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고도의 성장과 이윤추구를 절대적 목표로 삼은 자본주의 속에서 물질문명의 발달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60 년대의 경제 발전은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두었으며, 정신적인 요소들은 철저히 배척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문화의 배제는 사회적인 신뢰기반을 약화했고,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인문학이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을 도외시한 우리의 삶의 틀은 자연의 순리와 조화의 범위를 벗어났고 황폐화 되고 척박해진 인성과 사회적 풍토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7 월 28 일(목) 오전 7 시 프레스센터 20 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을 주제로 제 10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발제자인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어떤 이론의 난무보다도 우리의 문화유적을 돌아보면서 직접 느끼는 감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현장에 가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고, 착하게 살고 후손들을 위해 어떤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에 진정성 있는 영감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진정으로 바람직한 착한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발전 속에 품격과 더불어 사람 간의 조화,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 즉 상생과 공존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인문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연을 대해야 합니다.

토론자인 김학범 교수는 착함과 순수함이라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배움을 통해 진정한 국가 선진화의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옛 선인들은 인문정신을 묘사한 산수화, 격조 높은 경관시와 다수의 문집을 통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깊은 철학적 사유와 인문적 사고를 새겨 놓았으므로, 대자연과 인문정신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로 나선 신숙원 교수는 우리의 역사문화에 깃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소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 깃든 '착한 선진화'의 핵심 가치를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과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수성과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생태여행 및 생태관광, 작은 텃밭 가꾸기 등 가정, 학교, 사회 등 여러 차원에서 자연 체험의 학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과 안목을 갖춘 '문화해설사'의 교육 및 자격인증을 통해 우리가 심도 있는 역사 문화 탐방을 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환경'을 정규교과과목으로 지정하면서 관심을 두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서 큰일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부터라는 마음을 지니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민방위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중요성을 일깨우고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경험 또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 년 전국 2 천 23 개 고등학교 중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672 개교(33.2%)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약 65%의 학생들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에 '환경과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목의 구성은 환경보존교육이 주됨은 물론,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보편적 가치가 기반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역사문화 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삼백다례원과, 달팽이학당을 연계해 추진하는 작은 학교 문화탐방은 상주의 옛 그릇에 대해 전시실을 둘러보며 활동지를 풀어보는 프로그램과 전통 차 마시는 법 및 기본예절을 배우게 되고, 이안면의 '분도요'에서는 물레 체험과 흙을 두드려 나만의 접시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일반학교에도 적용되고 정규교과로 지정된다면 우리는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 속에서 착한 선진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보호, 나눔, 베풂 등 핵심적 가치들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을 좀 더 적극적이고 가까운 곳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플리마켓(Flea Market)을 개최하거나 기부받은 중고품을 재사용, 재순환하면서 사회자선 및 공익사업에 쓰는 상점과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플리마켓을 개최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학생들은 나눔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연보호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등 사회적 단체와 연계를 통해 기부문화를 습득하고 '환경보존, 나눔과 베풂' 등을 습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기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의 가치뿐만 아니라 착한 선진화의 핵심 가치인 공존, 소통, 공유, 나눔과 베풂을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⑥ 김효정(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우리는 단군설화로부터 신라의 화랑도 그리고 조선의 선비정신으로 이어지는 반만년의 면면한 역사 속에 자연은 섭리로 존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고 자연 속에서 자아를 찾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공부와 처신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으며 호연지기는 모든 사람의 선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연을 도외시한 우리의 삶의 틀은 자연의 순리와 조화의 범위를 벗어났고 우리는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황폐화 되고 척박해진 인성과 사회적 풍토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성 있고 지혜로운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국 선진화 포럼은 2016 년 7 월 28 일(목),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전신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제 10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배용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은 하늘을 경외롭게 여기고, 대지에 대한 숭고함과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겸허한 자세가 늘 한국 역사문화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천인합일'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문정신을 앞세워 최근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사회 각계에서 자연체험과 학습 기회를 확대해 감수성과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김학범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연과 인문정신 등 자업의 섭리에 대한 배움을 강조했습니다.

이배용 원장은 "인간의 겸허한 자세가 늘 한국 역사문화 속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한국의 정신문화에 깃들어 있는 화합과 소통의 정신, 인간주의적 사랑, 인간과 자연의 조화, 나눔과 베풂의 정신, 인간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진정성은 세계화와 개방화, 융합의 시대에 인류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배용 원장은 "글로벌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신뢰 속에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세상의 평화는 인간끼리의 소통과 화합만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정신문화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은 우리의 문화유적을 돌아보면서 직접 느끼는 감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문화현장에 가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에 대한 경외로움이 있고, 착하게 살고 후손들을 위해 어떤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에 진정성 있는 영감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거나 정원을 꾸밀 때에도 반드시 자연과의 조화를 우선시했습니다. 과도한 인공조경을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해석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하나 되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의 세계화와 개방화, 융합화의 시대적 추세 속에서, 인류는 당면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인류 평화와 복지 증진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과연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할 때, 한국의 정신문화에 깃들어 있는 화합과 소통의 정신, 인간주의적 사랑, 인간과 자연의 조화, 나눔과 베풂의 정신, 인간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진정성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줍니다.

이번 추석, 긴 연휴동안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어 집 근처의 문화재를 둘러보려 합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에 깃들어 있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몸으로 느끼고, 그 벅찬 감동을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⑦ 유선호(서강대학교 경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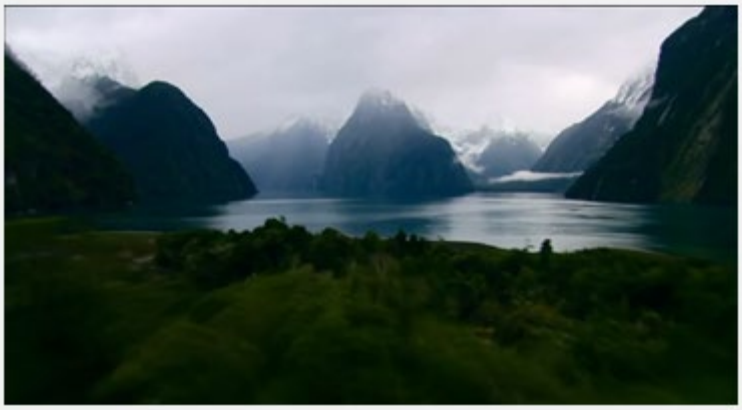


착한 선진화와 자연친화성의 연결고리

최근에 사드 배치 논란 등의 사회 국제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찾고 착한 선진화의 길을 자연 속에서 찾고자 지난 2016 년 7 월 28 일 목요일 한국선진화 포럼에서 제 105 차 월례토론회가 개최하였습니다.

착한 선진화라는 것은 자연에 친화적이고 착한 심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착한 선진화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선진화라는 개념과 착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융화될 수 있을까요?

선진화라는 단어는 사회과학적인 용어라 볼 수 있고 착한은 인문학적 용어라 할 수 있는데 둘이 같이 쓰임으로써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에 있기에는 어느 정도의 모순이 존재하는 '착한'과 '선진화'

시장경제자체는 자발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사람들의 본성에 따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시장경제 자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법과 제도적인 어떤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사유재산 보호, 문제시 사법시스템 등의 사회적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노력이 있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즉, 선진화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회적 장치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엔 여기서 자연 속에서 조상의 인문학적 견해를 본받고 역사를 아는 것에서 착한이라는 의미가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 속에 깃들여져 있는 조상의 인문학적 견해

그렇다면 착한 선진화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인 오늘날의 세상에서 대자연과 함께 천인합일의 보편적 가치를 우리 역사문화 유적에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착한 선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상생과 공존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간의 조화,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를 전제로 한 착한 심성이 중요합니다.

자연이 그토록 강조되는 이유는 자연이 인류문화를 가능하게 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동양문화의 핵심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하나된 상태에서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동양의 자연관은 이러한 인문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연을 대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입니다. 자연의 모습에 다양한 인문적 의미와 상징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세기며 깊은 철학적 사고를 하면서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찾는 행위가 진정한 한국적 자연입니다.

우리 모두 자연의 섭리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연과 인문정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배우며 진정한 국가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자연과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연이 우리 생명의 터전이고 스승이자 예술의 보고로써 이러한 자연의 가치를 착한 선진화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요구됩니다. 요즘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자연을 개발의 도구로만 간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자연보존이 필요합니다.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에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테면, 에너지 절약하기 등의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동 실천의 작은 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텀블러를 자주 활요함으로써 일회용의 사용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보호 의식과 더불어 우리 자연에게서 착한 선진화의 핵심가치인 공존, 소통, 공유, 나눔과 베품을 터득하고 배운다면 우리는 자연과 함께 어깨 동무하며 따뜻한 동행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⑧ 이권식(한양대학교 경제학과)



대자연과 함께 하는 착한 선진화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 일본의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자리한 아름다운 우리강산은 황폐화가 되었으며, 고도성장과 이윤추구만을 절대적 목표로 삼은 자본주의 가치관으로 인해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정신적 문화의 가치가 퇴색되었습니다.

특히, 물질문명의 발전속도보다 정신문명의 발전속도가 뒤쳐지는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과거 인본주의로 꽃을 피웠던 찬란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더 나아가 배금주의, 천민자본주의 등 몰인간적인 가치관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저변에 확산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의 상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 선진화 포럼은 지난 7 월 28 일 오전 7 시 프레스센터 20 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105 차 월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용 원장은 "인간이 자연의 힘에 도전하고 자연이 주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서 형성된 문화가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었지만, 과학과 기술의 고도의 발전으로 초래된 환경의 불균형과 생태계의 파괴, 휴머니즘의 상실 등이 21 세기의 과제로 남았다"며 이번 토론회의 발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휴머니즘의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선 단군의 홍익인간, 불교의 화쟁사상을 기본으로 한 이타행, 유교문화의 역지사지, 그리고 인간주의 정신 등 대자연의 섭리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음을 일깨워 준 우리 선현들이 쌓아온 인문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문정신의 회복은 그 어떤 이론의 난무보다 사대문, 성곽, 궁궐 그리고 종묘사직 등 전국 곳곳에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직접 돌아보면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화합과 소통의 정신, 인본주의, 자연과의 조화, 나눔의 정신 등을 사색할 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인 김학범 한경대학교 교수는 "오늘날 고도로 물질문명이 발전된 21 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대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국가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발제"라며, "오랜 세월동안 인문정신이 쌓여온 우리 자연을 바탕으로 진정한 국가선진화 방향은 심도있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 109 개 명승의 특이한 점은 곳곳의 명승에 모두 다 하나 같이 인문학적 의미와 상징이 가득 베어 있다"며 "선조들은 자연의 모습에 다양한 인문적 의미와 상징을 새기는 일이 자연을 그냥 보존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문적 의미가 겹겹이 쌓인 자연을 통해 인간 본연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연의 가치를 체득하기 위해 자연체험 학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신숙원 서강대 교수는 "우리의 역사문화에 깃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소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 깃든 '착한 선진화'의 핵심 가치를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과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를 '착한 선진화'와 연결시키려면 가정, 학교, 사회 등 여러 차원에서 자연의 가치를 체득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자연체험의 학습이 필요하며, 품격 높은 문화유산 유적지 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식과 안목을 갖춘 문화해설사를 키우기 위한 수준의 교육과 자격인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심에 숲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보존교육과 운동, 그리고 에너지 절약, 쓰레기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 보호운동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자연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따뜻한 '동행의 길'을 갈 수 있는 착한 선진화의 실천방안"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오늘날 과도한 물질적 풍요로 인해 자연이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무분별한 자연 훼손과 자원낭비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의 불균형과 생태계의 파괴, 휴머니즘의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자연의 섭리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음을 일깨워 준 우리 선현들이 쌓아온 인문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계태엽처럼 돌아가는 현대인의 일상을 미루어 볼 때, 대자연 속에서 이러한 인문정신을 회복하자는 주장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인문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보다 손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3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 곳곳에 문화유산 유적지로 향하는 숲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도시 곳곳에 조성된 숲길을 거닐면서 바쁜 일상으로 인해 지쳐버린 심신을 달래고 사색에 잠길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숲길을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문화유산 유적지로 발길을 향하게 만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명승지 근처에 숲속교실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명승지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생태학습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선현들의 인문정신을 학습하는 교육 과정을 곁들인다면 인간 본연의 측은지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이름을 붙인 나무 심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일반적인 식목 운동은 일회성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장기적인 활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나무에 개인의 소유권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름을 붙인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연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어느 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없는 공유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기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 방목장에선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끌고 나오는 것이 이득이므로, 그 결과 방목장은 곧 황폐화된다는 걸 경고하는 용어입니다.

경제학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사적 소유권'을 확립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름을 건 '나무'를 심어 사적 소유권의 개념을 개인에게 인지시킨다면, 자신의 나무의 원활한 생장을 위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국가, 또는 기업 차원에서 산지 등에 숲을 조성하는 녹화사업(綠化事業)이 개인 차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다양한 나무의 숲이 조성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숲 조성은 미세 기후조절, 열섬현상 해소, 각종공해저감, 생물서식 공간 제공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을 통해 도시전체의 품격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자신의 이름을 붙인 나무 심기 운동이 국가적 차원의 숲길 조성 운동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면, 21 세기의 과제로 남은 환경의 불균형과 생태계의 파괴, 휴머니즘의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자연을 통한 '착한 선진화'의 실천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첫걸음은 여러분이 심은 '작은 나무'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우리 모두가 자연과 함께 하는 '착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붙인 작은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⑨ 이효은(건양대학교 글로벌마케팅학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대한민국은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예로부터 내려온 선조들의 아름다운 자연사랑 정신을 잃어버린 채 산업화의 부산물인 환경오염의 피해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7 월 28 일 서울 중구에 위치해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제 10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용 원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어떠한 이론을 내세우기보다 우리의 문화유적을 직접 돌아보며 느끼는 감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거나 정원을 꾸밀 때에도 반드시 자연과의 조화를 우선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인공조경을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해석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하나 되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사회갈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의 화합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자 노력했던 선조들의 모습이 담긴 사대문과 성곽, 궁궐과 종묘사직과 같은 문화유적을 탐방하며 그들의 소통과 화합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토론자인 서강대학교 신숙원 교수는 발제자의 논증에 깊이 공감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소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 깃든 '착한 선진화'의 핵심 가치를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과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전등 문화유적

착한 선진화의 핵심적 가치인 공존, 소통, 공유, 나눔과 베풂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인합일'의 보편적 가치가 기반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역사문화 유적의 탐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깊이 있는 설명을 위해 넓은 지식과 안목을 갖춘 문화해설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경대학교 김학범 교수는 자연은 인류문화를 가능하게 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며, 착함과 순수함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진정한 국가 선진화의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옛 선인들은 자연과 하나 되는 천인합일 정신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자연의 깊은 철학적 사유와 인문적 사고를 담은 산수화, 격조 높은 경관시와 다수의 문집을 통해 한국인의 고유의 인문정신을 담은 한국적인 자연을 만들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과 소통하며 조화를 이루어낸 우리 조상들의 공동체 의식을 물려받아 현재 대한민국에 팽배해 있는 매몰찬 경쟁주의를 해소하고 자연과 함께 진정한 선진화를 이룩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에서 제외된 환경 교육을 되살려야 합니다. 2015 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그 결과 2016 년 전국 2023 개 고등학교 중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672 개교(33.2%)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에너지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극복해 나가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생명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과중심의 이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찬란한 전통 문화유적을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체험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는 자연의 속성을 거슬러 삶의 터전을 지나치게 인공화하거나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으며,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활용하고 부족함이 있는 곳은 약간의 풍수적 비보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해 나갔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문화유적에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통 문화유적 탐방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환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담겨있는 선조들의 조화사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신뢰 속에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인간끼리의 소통과 화합만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들의 전통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의 길을 열어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⑩ 장정욱(경기대학교 경영학과)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선진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고도성장과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가치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화란 것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의 조화, 이웃에 대한 나눔 등 '품격'이 있어야 진정한 선진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는 한국의 전통 인문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한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보호나 자연보호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유산은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궁궐과 성문, 왕릉까지 대부분의 주요 건축물과 문화재들이 유교와 동양 전통사상에 의해 입지 선정과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 있지요. 타 문화와는 구별되는 특유의 세계관과 종교관, 자연관에 입각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선진화는 이러한 한국의 전통사상을 함께 발전시켜 인문정신을 함께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은 모두 인문학적 의미가 배어 있다

토론회의 발제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용 원장은 '선진화는 앞서가는 것 속에 발전이 있고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질만능이 아니라 문화적 향유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를 세계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선진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은 우리의 심신을 치유하는 손길이며 생명의 터전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 차원에서 자연체험의 기회를 늘리고 더불어 품격 있는 문화유산과 유적지도 함께 탐방하며 교육해야 합니다.

토론에 참여했던 한경대학교 조경학과의 김학범 교수는 국가 지정 명승은 역사문화명승과 자연명승으로 구별되며, 인근의 일본이나 북한보다도 명승의 수는 비록 적지만 모두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신이 깃든 인문학적 의미가 배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명승을 둘러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수한 문화해설사를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의 가치를 지닌 문화재와 자연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널리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문화해설사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이를 통해 우리 전통을 형성하는 인문 정신을 배양한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식을 성장시켜 사회의 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배양하는 초석은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와 동시에,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것을 잘 풀어내어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수한 문화해설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문화해설사가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튼튼한 인문학 연구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인문학이 부족한 현 사회의 문제점들을 타개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⑪ 전도훈(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생태 관광의 활성화를 제안해보다.

고속 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고통 받는 현대인들을 보며, 자연과의 상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이 7 월 28 일(목) 오전 7 시 프레스 센터 20 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제 10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자 이배용 회장은 “매력적인 고도성장은 이제 멈춰지고 있는 상태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 되면서 격차는 커지고 불만은 심화되어 공동체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치와 공존을 화두로 삼고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한다" 고 발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단군 설화로부터 신라의 화랑도 그리고 조선의 선비 정신으로 이어지는 반만년의 면면한 역사 속에 자연은 섭리로 존재했음을 볼 수 있고, 자연 속에서 자아를 찾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공부와 처신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으며 호연지기는 모든 사람의 선망이었다"고 역설했다.

토론자 신숙원 명예 교수는 "착한 선진화의 핵심적인 가치인 공존, 소통, 공유, 나눔과 베품에 공감하며, 발제자의 논증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서 착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어 “‘자연의 핵심 성품인, 생명성, 교훈성, 예술성, 치유성, 소통성을 이해하며, 이러한 자연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착한 선진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실행방안으로 '자연 체험 학습의 실행'과 '품격 높은 문화유적지 탐방 그리고 '자연보호운동'이다"고 말하였다.

이에 토론자 김학범 교수는 "자연, 그 중에서도 한국의 자연은 아름다우며, 한국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오늘의 발제에서와 같이 자연의 섭리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이제 지식 창조의 시대에 걸맞게 선진화 방향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경향이 있다. 생명 탄생의 시발점은 자연이고, 죽어서도 우리는 자연으로 회귀하게 되지만, 살아 있으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기는 커녕, 훼손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를 만드는데 급급하다.

선진 시민이 되려면, 이러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잊지 말아야할 사실은 자연과의 공존에 실패하면, 인간은 재앙적인 파국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해야한다는 말은 아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도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자연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연과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필자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제안해본다. 생태관광이란,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으로 인한 수익은 지역의 생태계 보전이나 지역주민에게 되돌아가는 방식의 관광이다.

기존의 관광이 알게 모르게 문화유적의 훼손, 지역사회의 전통의 훼손, 관광지의 지역민의 경제적인 박탈감, 대규모 관광산업의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 등의 소모성 관광의 측면이 강했다면, 생태관광은 이러한 병폐를 막고, 환경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전남 순천의 순천만은 생태 관광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자연과의 상생의 실현과 관광객의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실제로 재작년 10 월 중순 열린 순천만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역 특산품 구매와 숙박 등에 지출한 금액은 634 억 5000 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생태관광의 일부인 체험형 관광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 관광객들 발에 짓밟힌 2 차 자연 훼손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일선의 시각이 있다. 하지만, UN 이 캐나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에 대한 “퀘벡선언”을 한 사실에 입각했을 때, 이러한 문제는 아주 일부분이다.

생태 관광의 부정적 측면을 물론, 인지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희생할 부분을 희생하고, 차차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생태 관광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생태 관광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바로, 생태관광 관련 법 제도의 미비이다. 30 여년 전부터, 세계 여러나라에서 생태관광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생태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관광 관련법이 추진되어 생태 관광의 정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비교적 관련 법률이 잘 정비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 관광의 정의를 '우포 늪, 순천만 갯벌 등 우수한 자연 자원과 주변의 역사, 문화 자원을 체험을 통해 느끼고, 관찰하는 관광'으로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의 정의가 아니라, 유관 단체의 임의적 정의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생태관광 추진법'을 2008 년부터 추진하여, 계속 시행되어 오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관련 제도의 정비이다.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후죽순처럼 생태관광이 생겨났지만,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은 눈씻고 찾아보기 힘들다. 바로 이 부분이다.

진정한 의미의 생태 관광이란 자연 생태계를 탐방하는 작은 여행이다.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안고 수수하면서도 단출한 여행이다. 지나치게 고상한 관광 상품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앞에서 제기됐던 2 차 환경 피해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갯벌에 몰아 넣어, 조개와 각종 어패류들을 주워만 가는 것은 생태 관광이 아니다. 형식적인 생태 관광은 생명에 대한 외경(畏敬)을 잃어 버린 채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단면을 보여준다.

관련 제도의 정착화와 더불어, 진정한 의미의 생태 관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생태 관광은 이번 월례 토론회에서 제기 되었던 문제인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과 부합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⑫ 정영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한국 사회는 공동체의식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공동체 의식 수준에 있어서 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하고 사회 구성원들 상호간에 유대감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UN 이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50 위권 수준에 불과했다. 물질적으로는 세계 11 위 경제대국으로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매몰찬 개인주의, 돈만 알고 나 자신만 잘살면 된다는 사회분위기와 경쟁에서 모두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

우리 세대도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말하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의 불안과 정신적 피폐를 토로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질문명의 한계, 냉엄한 자본주의가 갖고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추구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그 동안 우리가 경시 해왔던 대자연에 있다.


대자연은 상생과 공존, 조화입니다

대자연은 온화로움과 상생이다. 가까운 산이나 바다에 가보면 원초적인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 자연은 세상 만물의 공동의 집으로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어 왔다. 따스함으로 모든 존재들을 보살피며 공존와 베품 그 자체 이다.

자연은 순리이기도 하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오는 법이다. 이는 아무리 과학물질문명이 발달해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자연은 조화로움의 지혜를 보여준다. 자연 섭리의 흐름속에서 만물은 다른 존재들과 조화와 상생을 추구한다.

이처럼 자연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놓치고 살았던 조화와 공존, 상생의 가치를 일깨워 주며, 인간을 겸손하게 한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의 울림과 지혜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자연과 함께 하고자 했던 우리 선현들의 지혜

중요한 점은 우리의 선현들께서는 이러한 대자연의 지혜를 이미 깨닫으시고 그분들의 삶속에서 실천해 오셨다는 점이다. 한중일의 전통 건축물과 조형양식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중국은 워낙 대륙이 넓기 때문에 산만 있는 곳은 산만 보이고, 바다가 있는 곳은 바다가 보인다. 자연물들이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양식이 발달했다. 반면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해 자연이 두렵다. 그들은 자연에 인공적 조작을 가하고 통제하고자 했다.

반면, 한국은 건축물을 지을 때도 자연속에 어우러짐 그 자체 였다. 산과 강, 바람의 흐름속에 건축물이 자연스레 자리하고 색감도 자연색이다. 주변과 소통하며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었다.


우리의 명승을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이 선현들의 지혜의 울림을 깨닫기 위해서는 대자연과 전통문화유적의 현장에 가서 직접 느껴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현들의 지혜를 보존하고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명승이 겨우 100 여개 남짓 지정되어 국가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을 뿐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는 360 여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중국은 그 수가 3000 여개에 이른다.

명승은 대자연의 울림과 선현들의 지혜가 있는 곳이다. 명승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서 우리 전통윤리 도덕감정을 느낄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장소로 삼아야 된다.

⑬ 최상연(한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자연에서 배우는 공동체 정신은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빠르게 성장해오던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으며 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관료들, 관피아의 등장과 정부를 믿지 못하는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의 화합이 중요시되는 이 때, (재)한국선진화포럼은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제 10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착한 선진화를 자연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한국선진화포럼 이배용 회장은 자연의 다양성을 헤아려야 자연이 도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제시하며, 자연을 통한 인성교육과 자연에서 비롯된 인문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공동체 정신은 물질만능주의가 판치는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정신이라 일깨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과 함께했던 선조들의 삶을 사대문과 성곽, 궁궐과 종묘사직, 왕릉과 같은 문화유산에서 엿볼 수 있으며, 선조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었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자연을 보호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며 후손에 전해줘야 할 우리의 임무를 제안하였습니다.



자연은 공존, 소통, 공유, 나눔, 베품의 가치를 함양하고 있습니다.

토론자인 서강대 신숙원 명예교수는 발제자의 논증에 동의하며 착한 선진화의 핵심적인 가치인 공존, 소통, 공유, 나눔과 베품이 자연과 역사 문화유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자연은 생명의 터전이자 스승이며,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심신을 치유하기에 우리가 돌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신 교수는 자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자연체험의 학습으로 자연의 언어를 느끼고,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문화재 속에 깃든 자연을 공부하며 '나' 부터 일상 속에서 자연보호 운동에 앞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문화는 자연이 허락한 것 입니다.

이에 토론자 한경대 김학범 교수는 오스트리아 삼림미학자 웨슬리의 “숲 없이 문화 없고 문화 없이 숲 없다” 라는 말을 인용하며, 고도의 물질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류문화는 자연이 가능하게 만든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발제문에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삶을 본받아 자연적인 아름다움 속에 문화의 의미를 깊이 새겨 두면서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말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창조시대에 걸맞게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삶을 영위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선진사회를 위해서는 ‘나’부터 자연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자연 사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편한 것에만 익숙해왔던 우리는 일회용품 안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조금은 불편하지만 자연을 위한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가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자연에 너무나도 무관심한 현대인들을 위해 현재 자연파괴의 심각성을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리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연을 중점으로 다루는 TV 프로그램이나 카드뉴스를 제작해 주변에 알리고, 자연 사랑 실천방법을 다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던 선조들의 자연 사랑 정신과 공동체 정신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선조들은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감을 다 따지 않고 일부는 새들을 위해 까치밥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감을 먹은 까치가 날아다니면서 씨앗을 다른 곳에 옮기면 그 자리에서 감나무가 자라나게 되어 다른 이들과 후손이 먹을 수 있는 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디 자연물을 사랑하고 자연과 이웃과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갔던 선조들을 본받아 물질만능주의와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을 바탕한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이웃과 서로 협력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과 자연의 혼이 담긴 문화를 보존하고,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공존, 소통, 공유,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한국의 문화는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모든 이가 오고 싶어하는 문화 선진 관광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을 드높이며 선진국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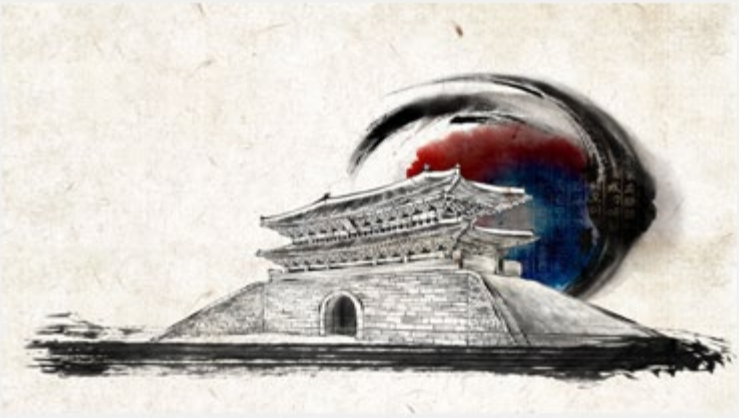
⑭ 하성수(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앞으로 정보 통신, 생명공학, 우주공항,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생활의 혁명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은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과학과 기술의 고도의 발전으로 초래되는 환경의 불균형과 생태계의 파괴, 휴머니즘의 상실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 또한 심각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매몰찬 경쟁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사회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246 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현대 과학 기술 혁명이 초래한 휴머니즘의 상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재) 한국선진화 포럼은 7 월 28 일(목) 오전 7 시 프레스센터 20 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 실천 방안'을 주제로 10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적에는 '인문정신'과 자연과의 '조화정신'이 녹아있다!

발제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용 원장은 자연은 휴머니즘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인성교육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 방안은 어떤 이론의 난무보다도 우리의 '문화유적'을 돌아보면서 직접 느끼는 감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유적'을 방문하여 우리의 정신문화에 깃들어 있는 화합과 소통의 정신, 인간주의적 사랑, 인간과 자연의 조화, 나눔과 베풂의 정신, 인간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진정성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잃어버린 휴머니즘을 회복하여 각종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노선도 속 곳곳에 숨겨진 '선릉역', '경복궁역', '동대문역'과 같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화유적'부터 방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연' 속에는 '착한 선진화'의 핵심가치가 깃들어 있습니다!

토론자인 서강대 신숙원 명예교수는 우리의 '문화 유적'에 깃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소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 깃든 '착한 선진화'의 핵심 가치를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의 가치를 이해하고 '착한 선진화'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정, 학교, 사회 등 여러 차원에서 자연체험의 기회와 학습을 운영하여야 하며, 둘째, 깊이 있는 지식과 안목을 갖춘 '문화해설사' 육성을 통해 품격 높은 문화유적지 탐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셋째, '도심에 숲 / 공원 가꾸기'와 같은 큰 틀에서의 '자연보호운동'과 '물 아껴 쓰기', '쓰레기 줄이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보호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경대 조경학과 김학범 교수는 오랜 세월 동안 인문정신이 겹겹이 쌓여온 우리 강토 위에 대자연과 인문정신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명승 방문을 통해 고유의 역사와 문화, 인문정신 즉,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연'과 '문화재'를 제대로 공부하여 '진가(眞價)'를 알아봐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연의 가치는 너무나도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만 생각하며, 우리나라 금수강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외국의 명소를 찾아가 감탄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재와 선조의 정신과 문화는 배우려 하지 않으면서 외국의 문화를 배우려는 풍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자연과 문화재, 전통정신은 선진사회 건설의 토대가 되는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진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연환경, 문화재를 제대로 느끼고 공부하며 그 가치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것을 등한시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금수강산을 가꾸어야 합니다.



'자연'은 '선진사회 건설의 길'의 '동반자'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우리 금수강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승과 문화재를 소개하는 책자는 단순 소개를 넘어 우리 선조의 '휴머니즘'을 감동으로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해설사' 선정의 기준을 대폭 높여 깊이 있는 지식과 안목을 가진 '문화해설사'를 육성하여 문화유적 탐방의 질을 높여 '고급화'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문화체험'의 기회를 늘려애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국가는 자연이 우리의 동반자임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나무 심기 캠페인, 머그컵 사용하기 캠페인과 같은 작은 노력부터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사회 전체의 자연보호 분위기를 리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문화재, 명승을 자세히 보고 이해하려는 개인, 기업, 국가의 노력은 '자연'에 대한 현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자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여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 1차 선진화 연구모임

조선희(고려대 식품자원경제 3) : 제 1 차 고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 월에는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선진화포럼에서 105 차 월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나친 경쟁주의에 매몰되어 '함께'라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함께 공존하기 보다는 경쟁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에 올라서서 쟁취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되나요?

인간은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 다함께 착한 선진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이에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이루는 방안 중 하나로 '교육 속에 자연을 담아내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숲이나 화단을 가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준용(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우리사회에서 대학 학벌이 가지는 중요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은 대학 입시, 경쟁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체험학습 중 자연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자연체험학습의 비중을 늘리고,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원을 가더라도 단순히 동물을 관람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동물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식물원을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씨앗을 받아와서 직접 심어보고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조를 이뤄서 함께 교내 숲이나 화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이와 더불어 함께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자현(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현장에서조차 등수를 매기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함께의 가치를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교내 화단이나 숲을 조를 이뤄 함께 가꿀 수 있도록 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인문학적 가치가 담긴 고전문학읽기를 장려한다면 어떨까요?

조선희(고려대 식품자원경제 3) : 이와 더불어 자연의 가치를 아름답게 표현한 여러 고전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때 문학교과서에서 정철의 '관동별곡'을 배웠는데, 그 안에 아름답게 표현되어있던 자연의 모습이 무척 감명 깊었습니다.

또한 고전문학작품에는 자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인문학적 가치들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을이면 고개를 숙이는 벼를 보면서 겸손의 미덕을, 곧게 자란 대나무를 보면서 선비의 꼿꼿한 절개를 노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자연 속에 담겨있는 인문학적 가치들을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임성균(고려대 식품자원경제 4) : 하지만 고전문학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어휘나 어투가 많이 낯설고 한자가 많아 저도 처음 접했을 때 엄청 어렵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 외에 따로 고전문학을 찾아 읽어보려는 노력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보편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문정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고전문학을 완벽하게 현대국어로 옮긴다면 어떨까요? 고전문학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읽기 어렵다'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국어로 옮긴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전문학에 담긴 여러 가치들을 중심으로 짧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방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의 활성화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권원중(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저는 교육이라고 해서 딱딱하고 틀에 박힌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미나 즐거움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것을 단순하게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자세로 대한다면 진정한 자연의 가치를 제대로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친화적인 테마파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숲속에 자연친화적인 숙박 장소를 만들어서 빌딩과 아스팔트에 둘러싸여있는 직장인들이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은 근처 농장들과 연계하여 열매를 직접 수확하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현민(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포장된 상태의 열매만을 접하기 때문에 과실이 나무에서 열리는지, 풀에서 열리는지, 넝쿨에서 열리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정자현(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요즘 여가활동으로 캠핑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캠핑문화도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연과 함께했던 부모님의 유년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주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교육에 스마트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성균(고려대 식품자원경제 4) : 이외에도 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고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불편함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설명이 주로 공익광고를 통해 이뤄져왔는데, 좀 더 국민들에게 친근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준용(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자연'과 '자연 교육'을 떠올렸을 때 다들 너무 딱딱하고 식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캠핑과 테마파크 외에 다른 교육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현민(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한 때 농장 가꾸기 게임이 큰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이처럼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보자면 지구를 운영하는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너도나도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자원을 낭비한다면 지구가 망가지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죠.

문정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게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쓰고 SNS 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연보호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취한 행동을 사진으로 찍어 SNS 에 인증샷을 올리고, 친구 두 명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지목받은 사람은 이틀 안에 각자 자연보호 인증샷을 올리고, 다음 인증샷을 올릴 두 명을 지목하도록 한다면 단시간 내에 널리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권원중(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맨 처음 캠페인을 시작할 때 인증샷에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짧은 글도 첨부하여 업로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교육으로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선희(고려대 식품자원경제 3) : 지금까지 '교육 속에 자연을 담아내는 방안'을 주제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학생들이 함께 숲을 가꾸도록 하여 자연의 가치와 함께의 가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의 가치가 담겨있는 고전문학을 읽도록 하는 방안, 자연체험 테마파크를 만드는 방안, 캠핑문화의 활성화, 자연 보호의 당위성을 담아낸 스마트폰 게임 제작, SNS 릴레이 자연보호 인증샷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논의가 마중물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자연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교육 방안들이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의견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②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착한' 선진화의 실천 방안은 자연 속에서의 사색입니다.

윤다영(산업인력 2): 안녕하십니까? 개강을 하고 바쁜 와중에도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선 대한민국은 단순한 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선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성장만을 목표로 하면서 지금 매몰찬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이 극도로 심화되어 이것이 이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이라는 수식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착한'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착한' 선진화의 실천방안은 자연 속에서의 사색입니다. 손 안의 휴대전화에만 빠져있는 현대인의 각박한 삶이 아니라 자연 속으로 나가 자연의 가치를 곱씹고 자연과 공존했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으며 배려의 마음 가짐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착한' 선진화를 위한 첫 단계로 삼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연 속에서의 사색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김란경(식물생산 1): 보통 사색은 혼자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통해 하거나 배운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윤다영 학우께서 자연 속의 사색을 주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자연의 섭리나 화합과 공존에 관한 책을 읽고 그를 곱씹으며 생각을 발전시키는 사색하는 것도 좋은 실천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선조들을 본받아 자연 속의 사색을 실천해야 합니다.

윤다영(산업인력 2): 제 실천방안은 선조들의 모습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을 가까이 했습니다. 서책을 읽을 때도 기와집에 나있는 창문으로 자연을 느끼곤 했죠. 저는 혼자 책을 읽고 하는 사색이 자칫하면 포용적인 생각을 잊게 만들고 우리를 경쟁사회로 내몰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 안의 사색 보다는 자연 속의 사색을 주장했습니다.

권수민(산업인력 2): 저도 사회갈등을 줄이고 '착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색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사색을 하는 것 보다는 자연 속에서 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연 속에서 사색을 더욱 많이 하도록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자연 속에서의 사색을 온 국민에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저는 국가 차원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글을 공모할 것을 주장합니다. 윤다영 학우께서 말씀하셨든 지금 현대인들은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빠져 자연 속의 사색을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사색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저 자연에 나가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사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글을 공모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자연 속의 사색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연을 주제로 한 글쓰기 공모전을 여는 것이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성호(식물생산 1):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착한' 선진화를 더욱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 관악구에서는 관악산을 소재로 한 글쓰기 공모전, 강원도의 도시들에서는 동해 바다를 주제로 한 글쓰기 등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으로 한정하여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재원(식물생산 1): 권수민 학우께서 제시하신 글 공모전도 자연을 소재로 한 많은 글을 받아 순위를 매기고 시상하는 방식입니다. 자칫 이러한 방식이 진정한 자연 속에서의 사색이 아니라 경쟁을 부추기는 모습으로 나타나 '착한' 선진화의 목표와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요?

권수민(산업인력 2):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나 글 공모전의 목표는 등수를 매겨 시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자연에서의 사색을 하도록 만드는데 있기 때문에 경쟁이 도드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가를 한 것에 의의를 두며 다양한 참가상 상품을 준비하고 자연에 대한 생각을 한 것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송병용(식물생산 1): 저는 윤다영 학우와 김란경 학우의 의견을 종합해 야외 도서관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도서관이 거의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선조들의 태도를 배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현대의 도서관은 자연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자연 속에 마련된 도서관에서 사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새롭게 지은 도서관인 관정 도서관에는 도서관 속에 쉼터 공간으로 미니 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입학 후 이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건물 속에 자연이 구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곳에서는 도서관의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쉼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약간의 책을 구비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야외 도서관으로 만든 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의 사색이 더욱 풍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자연과의 사색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속의 지식과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면 '착한' 실천화를 실현할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천재원(식물생산 1):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이에 덧붙여 저는 야외 도서관에 책을 읽을 공간과 더불어 지금처럼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다면 화합과 공존이라는 '착한'의 의미가 되새겨 질 것입니다.

임성호(식물생산 1):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책을 읽는 등 정적인 활동 속에서 사색이 행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도 동의하지만, 자연 속에서의 동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사색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걷기와 같은 동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에서의 사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국민들에게 하루 30 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면서 자연 속의 사색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책을 바탕으로 생각의 폭을 넓히거나 글을 쓰는 것도 사색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색한다고 의식하지 않고 사색을 하는 것도 사색의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걷기 시작하면 걸으면서 호흡을 통해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주변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어 자연을 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속에서 걷기 캠페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란경(식물생산 1): 동의합니다. 저는 사색을 가만히 앉아 곰곰이 생각하는 것에만 한정 지었었는데 걸으면서, 또는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겠네요. 또 이러한 사색의 방법들과 생각들이 '착한' 선진화를 실천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윤다영(산업인력 2):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착한' 선진화의 실천방안을 찾는 105 차 월례토론회로부터 나온 자연 속의 사색을 주제로 유익한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자연 속의 사색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연 속의 사색 자체에 대한 확대된 논의와 함께 자연을 주제로 한 글 공모전, 야외 도서관의 건립, 걷기 캠페인이라는 세 가지 실천 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이에 대한 보충 의견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통해 스마트폰에 현혹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자연 속을 거닐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배려하는 마음,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이를 잊었지만 사색을 통해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잊은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③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선진화 연구모임

이권식(한양대 경제 4) : 지금부터 제 1 차 한양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 월 한국선진화포럼은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10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나친 경쟁주의에 함몰되어 '공동체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없는 사회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초래된 분배의 양극화,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의 문제는, 어느덧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자연 속에서 인간 본연의 본성을 되찾으며, 우리 선현들의 문화유산 유적지에 녹아있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따뜻한 인문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선, '착한' 선진화 운동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착한' 선진화 운동은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자리매김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유적지로 발길이 향하는 숲길을 조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착한' 선진화의 실천방안은 '문화유산 유적지로 향하는 숲길을, 자신의 이름 붙인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붙어있는 숲길을 거닐면서 바쁜 일상으로 인해 지쳐버린 심신을 달래고, 사색에 잠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숲길을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문화유산 유적지로 발길을 향하게 만드는 기대효과가 존재합니다.

최혜린(한양대 프랑스언어문화 2): 저는 이권식 학우가 제안해주신 자신의 이름을 붙인 나무 심기 운동의 목적을 조금 변형함으로써, '착한' 선진화 운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이름을 붙인 나무를 향후 수목장(樹木葬)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나무 근처에 묻거나 뿌리는 친환경 장례방식입니다. 수목장은 인구증에 따라 나타나는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수목장은 납골당과 묘지보다는 관리나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목장림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목장림이 없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 토지와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목장림 조성을 위해 부지를 선정해도 주민 반대가 심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지역 이미지 훼손과 땅값 하락이 가장 큰 이유고, 수목장도 결국 묘지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인 나무를 수목장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조상의 수목장을 찾는 과정에서 조상들의 얼을 기리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대자연 속 인간 본연의 본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현지(한양대 프라스언어문화 4): 수목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수목장에 대한 공익광고를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지상파, 공중파를 막론하고 황금시간대에 의무적으로 광고를 편성함으로써, 국민들이 수목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고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몰인간적인 사고가 확산되는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선, 대자연 속에 선현들의 인문정신을 담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이러한 정신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 '착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공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익광고가 지속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찬혁(한양대 경영 4) :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본다면, 자신의 이름을 붙인 나무 심기 운동보다 수목장을 위한 나무 심기 운동이 개인의 참여 동기를 이끌어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더불어 공익광고를 통해 수목장을 둘러산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수목장이라는 문화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다면, 이권식 학우가 제안해주신 문화유산 유적지로 향하는 숲길을 수목장을 통해 조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숲길은 개인에게 대자연 및 선조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승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 폭에 사진에 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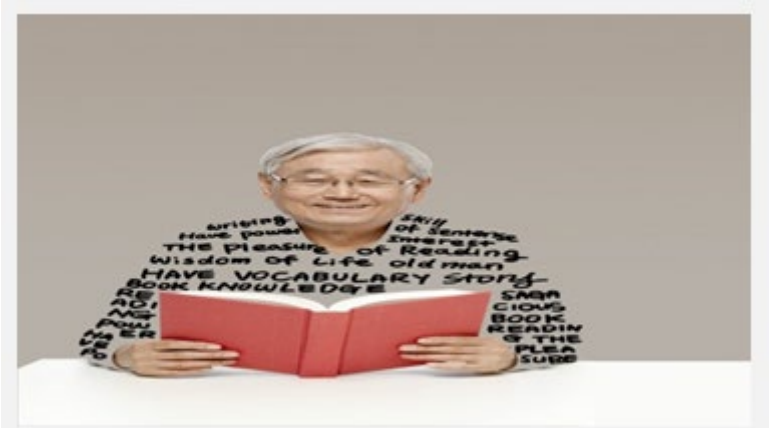
조동수(한양대 기계 3) : 저는 '착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다양한 명승지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위치한 명승지 방문을 국민들에게 독려가기 위해, '명승지 사진 한 컷 대한민국'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명승지 사진 한 컷 대한민국'이란 KBS2TV 생생 정보통 '미스터 Lee 사진 한 컷 대한민국'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으로써, 미션으로 제시된 사진 속 명승지를 직접 찾아가서 명승지의 아름다움을 한 폭의 사진에 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히, '명승지 사진 한 컷 대한민국'이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선 기업과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명승지가 프린트 된 제품을 생산해주어야 하며, 해당 업무를 중소기업에게 할당해주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명승지 사진 한 컷 대한민국'에 참여한 사람 중 일정조건을 수료한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아름다운 명승지를 방문하면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본주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해당 제품을 찾는 수요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에 상응하는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착한' 선진화 운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혜린(한양대 프랑스언어문화 2) : 조동수 학우가 말씀해주신 내용에 조금 더 아이디어를 보태자면, 단순하게 명승지 혹은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곳에 담긴 선조들의 인문학적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해설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노년층을 양질의 문화해설사로 육성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특히, 저소득 노년층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문화해설사로 양성한다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유휴인력의 감소 및 노인빈곤 문제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뿐만이 아니라, 명승지를 방문한 국민들이 인본주의 정신을 회복을 도모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지(한양대 경영 4) : 저 역시 양질의 문화해설사를 육성하는 것이 '착한' 선진화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유산, 명승지 등에 전해지는 구전 등을 재해석 및 스토리텔링하여 '남원춘향제'처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흔적을 담아내고 지역민의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지역만의 고유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지금도 다양한 지역에서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각 축제만의 특별한 개성이 도드라지지 않아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유적과 명승지 등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하나의 문화적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대자연 속에서 '착한'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자연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착한' 선진화를 이룩해봅시다!

이권식(한양대 경제 4) :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문정신의 회복을 도모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착한' 선진화 운동이 일회성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필두로 하여 문화유산 유적지로 향하는 수목장 숲길 조성하, 대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 명승지 사진 촬영 이벤트 개최, 양질의 문화해설사 육성, 문화유산 유적지 혹은 명승지를 스토리텔링한 지역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착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었으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한 '착한' 선진화가 실천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이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1 차 한양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④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정영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제 1 차 고려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는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이라는 주제로 제 105 차 월례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공동체 의식에 있어서 최하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매몰찬 개인주의, 돈만 알고 나 자신만 잘살면 된다는 사회분위기와 경쟁에서 우리 모두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경시되어왔던 대자연에서 공동체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대자연에는 소통과 공존,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현들의 문화유적에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따뜻한 인문정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과 달리, 그 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대자연의 가치가 경시되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대자연과 우리의 문화유적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제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방안에 대해서 다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대중의 관심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부터 그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역사, 문학, 윤리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문정신에 대한 교실에서의 배움이 문화현장 체험학습과 연계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인문정신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연이 주는 감동의 울림을 더욱 깊이 있게 느끼고, 대자연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호재(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연이 주는 가치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정영명 학우가 제안한 것처럼 학교수업과 연계된 현장체험학습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교주변이나 도시 근처에서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생태환경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 정부가 자연보호를 위해서 자연 및 환경관련 세금을 부과한다면 대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이라는 가치가 사회적 아젠다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문진언(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저도 대자연이 주는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이 직접 자연을 느끼고 대자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명승을 지정해 관리하거나, 문화유산을 관광산업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문화유산에 대한 내국인의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면 대자연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높아질 것입니다.

윤채현(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저도 이호재 학우의 의견처럼 자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지루한 것, 먹고 살기 바쁜 현실에서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래서 자연 휴양지에 가기보다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유흥거리를 즐기기에 바쁘죠. 만약 도시에서 일정부분은 자연 휴양림으로 조성되도록 지정한다면 젊은 층들도 여가 시간에 쉽게 자연에 다가갈 수 있고, 자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입니다.

강상민(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저도 윤채현 학우의 의견처럼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특히, 경제적인 생활과 큰 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20 대나 중고등학생들의 현실을 보더라도 인문정신보다는 상경계열, 취업에 관심이 많죠.
저는 정부가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정신 특히나 자연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인문정신이 산업부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다면 학생들이나 20 대의 자연, 인문정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겠죠. 인문학적인 가치나 소양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산업이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플의 스마트폰 혁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혁신의 단초 또한 인문학적 정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문학을 활용할 수 있는 벤처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도시에서도 쉽게 자연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정영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네. 다들 좋은 의견들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현실의 삶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니 자연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대자연의 가치를 깨닫고 관심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다들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산업 활성화, 도시에서 근접한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연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자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제고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 1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⑤ 한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최상연(한동대 컴공 2) : 제 1 차 선진화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7 월 한국선진화포럼은 “대자연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청방안” 이라는 주제로 10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빠르게 성장해오던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으며 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관료들과 정부를 믿지 못하는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의 화합이 중요시 됩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예로부터 공동체 속에서 살아온 선조들처럼 우리 역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 다 함께 착한 선진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이에 “자연과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나’부터 실천하는 자연사랑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에 너무나도 무관심한 현대인들을 위해 자연파괴의 심각성을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리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카드뉴스 제작 등 자연사랑을 일상생활 속에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실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연보호를 위한 환경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주선(한동대 국제 4): 저는 환경보호를 널리 알리기에 앞서 환경보호를 위한 교과목 개설이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양 과목으로 '환경과 인간' 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 수업을 통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보게 되며, 우리 주변에 무관심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가 확산된다면 일상생활 속 자연보호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황현정(한동대 제품디자인 2): 앞서 얘기한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합니다. 덧붙이자면 환경 관련 교과목이 실습 위주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가르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직접 오염된 지역이나 폐수처리장 등을 방문하여 그 속에서 보고 느끼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나무심기 캠페인 등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한동대 생명 2): 저는 '에코투어'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문화를 제시합니다. 에코투어란 단순히 보고 즐기던 관광에서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깨우쳐주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관광을 의미합니다.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면서 이를 SNS 에 공유한다면 자연보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내 에코투어를 좀 더 확산시켜 자연보호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최상연(한동대 컴공 2): 여러분의 의견을 듣다 보니 자연보호 역시 나 혼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연과 조화된 삶을 살았던 선조들은 자연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하나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옛 말이 된 것만 같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다은(한동대 심리 3): 저는 앞서 말한 국내 에코투어에 덧붙여서 문화유산 탐방도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문화재와 명승지에는 대자연이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혼이 담겨 있습니다. 옛 가옥들만 보더라도 낮은 담을 통해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다양한 문화재가 존재한 만큼 문화유산 탐방이 확산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조들의 공동체 적인 삶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릴 적 수학여행 이후로는 유적지 여행이 흔치 않기에 친구들과 함께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준규(한동대 생명 2): 저는 대학생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각 지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앞서 말한 전통문화체험도 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공동체 정신을 느낀다면 이는 더욱 더 많은 학생들에게 퍼지게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의 공동체리더쉽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시켰으면 합니다. 약 30 명으로 이루어진 팀원들이 매주 모여 온전히 학생들의 힘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에, 이 속에서 의견을 맞추면서 토론을 해 나가기도 하고, 학교의 발전을 향한 이야기도 오고 가기에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조금 더 확산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상연(한동대 컴공 2): 여러분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선진화연구모임에서는 월례토론회 주제의 연장선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보호 교과목 개설 및 실습 확대, 국내 에코투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의 혼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 탐방을 확대시켜야 하며, 전통문화체험이나 공동체리더쉽훈련 등 대학생들이 모여서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해주신 자연보호와 더불어 공동체 의식 회복을 통해 사회 속 빈번한 갈등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인 자연과 문화 보존을 통해 한국이 문화 선진 관광국으로 부상해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선진국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 1 차 선진화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화 과제 41: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제 106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내수 전반과 자영업계, 그리고 가계부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현 상황과 전망을 진단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을 직면하고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9 월 22 일 목요일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 위험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을 각각 주택매매시장, 주택임대시장, 주택금융시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거래량은 지방 5 개 광역시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감소했고 가격은 1.8% 상승했으며 공급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2018 년에 준공되는 아파트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시장이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가구 수 대비 주택 재고비중은 118%이지만 앞으로 주택공급물량은 증가할 예정이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비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단계입니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민들은 내집 마련보다는 임대를 택했고, 수요의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가 맞물려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택매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유도책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기에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침체를 벗어나 지난 2 년 동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과거 침체기를 탈출하면서 시장내부에서 일부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기능이 적절히 작동한다면 과열현상도 신속히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시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주택담보 가계대출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먼저 정부의 주택공급목표치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되었으므로 현행 목표치인 39 만호는 적절한 수준이며 다만 2015 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75 만호의 주택이 완공되는 2017~2018 년에는 과잉공급으로 인해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성향의 구매와 실수요자의 구매도 철저하게 구분하고 금리와 조세 제도도 이 둘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며 특히 고액의 전세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에 비해 적게 세금을 내고 있는 '무임승차자'들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지적했습니다. 저금리 환경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의 유입이 지속되었고,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품이나 지역에는 수요가 유지됨에 따라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가격성장의 둔화로 인해 지역 간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윤경 연구위원도 2017 년을 리스크가 현실화 될 수 있는 시기로 지목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수주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건설 산업 및 연관 산업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고, 공급물량의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도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주택의 과잉공급문제입니다. 2017 년이면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이 수요량을 크게 상회하여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주거 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자리를 잡고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 기숙사의 수용인원은 턱없이 모자라고, 학교 인근 주택의 임대가격은 주택의 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반 지하, 옥탑 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이 때문에 대학생의 본분인 학업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도 주택시장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택시장의 구성원이 주로 부부와 같은 가족단위였습니다. 주택의 공급 역시도 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3~4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주택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로 구성된 1 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이제 부부에서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을 위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의 특성상 이미 준공된 3~4 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택들을 1 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구조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각 방에 한명씩 분양하여 개인공간을 갖되 거실과 주방, 화장실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임대주택제도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수요에 맞춰 1 인 가구에 특성화된 주택들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원룸의 형태로 혼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독거노인 문제나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용공간이 확보된 주택을 보급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소모임을 결성하고 활동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매 해 공모전을 열어 우수활동 소모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는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주거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는 데 충분히 활용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문제는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들도 대학 인근 지역주택은 지방 자치단체의 주도로 대학생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되, 이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주택들은 최근 지방으로 자리를 옮긴 여러 공기업과 국책연구소의 젊은 직원들에게 정착 자금 지원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분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특성상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맞추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청년 주거문제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고,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② 윤다영(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부)



가계부채의 증가와 밀접한 부동산 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그와 밀접한 문제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의 위험요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선진화 포럼은 지난 9 월 22 일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빌딩 2 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제 106 차 월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와 올해를 중심으로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먼저 주택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착공물량이 2015 년과 2016 년 모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 지금 거래량은 줄고 가격 상승은 둔화되고 있다. 앞으로 공급물량에 대한 소화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주택임대시장에 대해서는 전세와 월세 가격의 하락과 상승폭 감소를 언급했고 주택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대출 증가 속도를 역설하며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비교하며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의 큰 원인은 분양물량 급증으로 인한 집단대출 확대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는가?

토론자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2 년 동안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대해 발제자에 비해 긍정적인 전망을 비쳤습니다.

특히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 보이는 몇 가지 문제들은 시장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면 신속히 해결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어 토론자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녹록치 않은 건설 산업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수주 감소와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한 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상품별, 지역별 건설 산업의 양극화와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화두로 던지며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백성준 교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리스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일정한 기준으로 통일하자는 것,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서 주택을 이용, 즉 살아가는 것으로 프레임이 바뀌면서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특히 지역 간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반면, 지방의 몇몇 곳에서는 빈 집이 남아 돌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수도권 대학 학생들을 위한 학사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들에게 주거 문제란 1 순위로 생각해야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학교 자체 기숙사와 자취방으로만은 해결이 쉽지 않죠.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들은 과잉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방의 건설사가 서울에 지방 학생들을 위한 학사를 지어준다면 이들 서로가 연계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현재도 서울에 지방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학사가 여러 곳 존재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상경한 학생들을 위한 학사 건립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인 가구의 증가로 주거 문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어서고 있는 이 때, 특히 지역 간의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상황에 지역 학생을 위한 학사 건립은 부동산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까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③ 김지영(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국내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월례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이 매우 더딘 가운데 대한민국 또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성장 분배양극화라는 뉴노멀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부진, 미국의 에너지 자립에 따른 저유가 문제, 그리고 해운 산업이 구조조정과 같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경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특히 자영업 종사자에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난제 중 하나이자 내수시장과 자영업 가계부채등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부동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선진화포럼은 9 월 22 일(목)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106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로 잡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흔들리는 경제 속, 부동산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송인호 (KDI) 연구위원께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우선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이 작년 하반기 이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1 분기 9.6%, 2 분기 10.8%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건설투자비중을 비교하여 보았을때도, GDP 대비 한국의 건설투자비중은 14.1%로 미국의 7.4% 일본의 10.3%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16 년에 다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성은 토목부문이 개선되고 건축부문 역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지만 현재 분양물량은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분양이 금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분양주택 수가 증가하였으며 주택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단위 : 전년동월(기)비, %)

구 분		2015년			2016년			
		연말	2/4	8월	1/4	2/4	7월	8월
전국		4.9	4.1	4.6	3.9	2.3	2.0	1.7
서울		6.7	4.1	5.2	5.7	4.3	4.1	3.9
(계절조정 전월대비)		0.6	0.7	0.7	-0.1	0.4	0.5	-2.5
	강북	6.0	3.1	4.3	5.3	4.1	3.8	3.5
	강남	7.3	5.0	6.0	6.1	4.4	4.3	4.2
	서초	7.7	5.3	6.2	6.4	4.9	4.9	4.7
	강남	9.7	7.2	8.6	6.5	5.8	5.6	5.4
	송파	5.3	3.6	4.2	4.3	3.0	2.9	2.6
지방5개광역시		5.4	4.6	5.0	4.3	2.3	1.9	1.6

자료: 한국감정원

서울 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주택매매에 있어서 지역의 차별화를 보여줍니다.

전국 주택가격은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며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적었던 서울의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전월세 거래량이 월세 거래가 감소로 전환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며 주택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월세통합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주택금융시장에서는 최근 가계대출이 1223 조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집단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남을 지적하시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로 현재 미국(79.2%) 일본(65.9%) 유로존(59.3%)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에 대해 건국대학교 고성수 교수님은 한국 주택시장의 현황은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기를 벗어나가고 있는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시장원리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리스크-리턴 관계를 정상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현황에 대해 한성대학교 백성준 교수님은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선진화의 방향성을 크게 3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리스크와 리스크프리미엄(금리)의 관계를 일정한 기준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적용하는 금리기준에 다른 상품들이 튀어나와서 시장 혼란을 야기하며 다양한 대출 상품을 내놓고 적용하는 금리도 각각 다릅니다.

마치 도로에 나온 차량이 모두 같은 신호를 따르고 차량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차가 같은 신호주기를 따라야 사고가 없이 다닐 수 있듯이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는 상응하는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낮은 투자에는 낮게 적용해 리스크-리턴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방법을 강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주택선분양과 후분양 그리고 소유와 거주의 과도기적 시점에서 부동산금융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전세와 매매의 세제상의 불공평을 해소하자고 하였습니다.

인식과 시장은 상당부분 소유에서 거주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는데 법과 세제는 여전히 소유위주로 굳어져 있음을 지적하시며 최소한 고액의 전세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금융 리스크, 주거불안 등은 현재 부동산시장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허윤경 연구위원은 건설투자 상황이 녹록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수출과 물가가 회복되어야 2017 년 경제 성장률 2% 후반 정도의 기록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역시 절대적으로 높은 잔액, 빠른 증가세, 부채 질의 악화등의 문제점을 우려하였습니다.

덧붙여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품이나 지역에는 수요가 유지됨에 따라 상품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며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의 차별화가 심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 년은 다양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선행적으로 건설수주 감소에 따른 건설산업 및 연관산업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 하방 압력을 확대하고 금융 리스크, 주거불안 등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분배양극화가 고착화 되는 뉴노멀의 시대가 지속될 수록 허윤경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 많은 리스크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주거불안 인데요, 저는 대학생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 자신이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오게 된 대학생들은 기숙사에 살기도 하고, 원룸을 구해서 살기도 하며 또는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사는 등 다양한 형태로 거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추첨에 떨어졌거나, 원룸이나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 비싸 자신의 주거공간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들도 더러 보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독거노인 - 하우스메이트' 사업에 '대학생 입주 쿼터제'를 제안합니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홀로 임대주택에 사는 노인에게 하우스메이트를 찾아주는 눈높이 합가(合家) 인연 맺기 사업인 '독거노인 - 하우스메이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주택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에게 거주공간을 필요로 하는 하우스메이트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거노인 - 하우스메이트' 사업은 독거노인과 주거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살림을 합쳐 경제 및 복지·심리측면의 안정을 이루도록 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에 하우스메이트로 들어오게 될 사람들 중에서 주거의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입주 할 수 있게 '대학생 입주 쿼터제'를 주택사업에 적용 할 것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일정 독거노인의 임대주택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독거노인분들에게 외로움을 덜어드려 보다 안정된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앞으로 '독거노인 - 하우스메이트' 및 '대학생 입주 쿼터제'가 활성화 되어서 독거노인분들은 삶의 활력을 가지고 대학생들은 주거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합니다.

④ 김지예(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106차 월례토론회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더딘 가운데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출부진과 함께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가져온 후폭풍이 저유가로 연결되면서 조선, 해운 산업이 된서리를 맞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영란 법이 발효되면서 자영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 내의 난제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내수 전반과 자영업 가계부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선진화 포럼은 지난 9 월 22 일 명동 은행회관빌딩 2 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 106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내 주택 과잉공급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발제자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부문은 건설 투자이며, 이중 특히 주택건설부문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분양물량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일부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2015 년도의 주택착공물량이 70 만호 수준이고 금년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여서 2017 년도 말에서 2018 년도에 걸쳐 준공되는 아파트 등 공급물량 소화 능력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2007 년 미국(99.9%)에 육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의 주택시장은 과거 침체기를 탈출하면서 시장에서 보이는 일부의 과열현상으로 다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시장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는 경우 신속히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날 토론자로 참석한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를 지적하며 “저금리 환경의 지속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상품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건설수주가 감소하게 되면 건설산업과 연관산업이 어려워지고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이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전망하며 “금융리스크관리와 주거불안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의 현행 목표치인 39 만호는 적정한 수준이지만 2015 년의 75 만호 주택건설실적(사업계획승인)은 수요대비 매우 높은 공급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주택건설실적이나 수주액이 경기에 선행하는 선행지표이므로 입주시점인 2~3 년 후 즉, 2017~2018 년의 시장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에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러한 현재의 주택 과잉 공급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학교와 민간 업체의 협력을 통한 재고 주택의 기숙사 이용은 어떨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여 공급과잉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저는 이 중, 부동산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교와 민간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외부 기숙사 존 형성이 주택 재고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대략 350 개에 달하는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체 기숙사로 대학교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교들이 학생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재고 주택을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편안한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업체는 과잉 공급된 주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과잉과 더불어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재고 주택의 기숙사로의 활용 방안은 지방에 있는 수많은 대학의 기숙사 신설비용 절약뿐만 아니라 지방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 양극화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⑤ 김현경(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부동산 시장의 암울한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 내의 난제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는 내수 전반과 자영업 가계부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2016 년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절대적 역할인 건설투자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가계부채 문제의 지속, 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9 월 22 일(목) 오전 7 시 명동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 위험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06 차 월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동산 가계부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발제자인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부문은 건설투자이며, 이중 특히 주택건설부문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5 년도의 주택착공물량이 70 만호 수준이고 금년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여서 2017 년도 말에서 2018 년도에 걸쳐 준공되는 아파트 등 공급물량 소화 능력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2007 년 미국(99.9%)에 육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의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토론자인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를 지적하며 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으로써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상품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건설수주가 감소하게 되면 건설산업과 연관산업이 어려워지고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이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금융리스크관리와 주거불안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로 나선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시장원리의 작동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선진화에 역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시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선진화를 위해 리스크와 리스크 프리미엄(금리)의 관계를 일정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는 상응하는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낮은 투자에는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주택의 개념이 주택소유에서 거주로,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어 부동산금융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을 벗어야 할 것이 많다고 첨언했습니다.



청년 주택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동산의 절망적인 상황과 함께 '청년 주거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월세난 심화와 함께 높은 청년주거빈곤율도 문제로 지적되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집은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내 돈으로 구매한 '소유'의 개념을 벗어나 거주를 하는 임대 형식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콩집'을 아시나요? 땅콩집이란 주택 1 필지에 주택 2 개를 붙여 두가구가 함께 살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저렴한 건축비에 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땅콩집은 전국 단위로 세워지고 있으며, 동탄과 일산 근교에는 땅콩집이 모여 있는 타운하우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건물을 주거용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저렴한 건축 비용과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선호가 맞아떨어져 기숙사나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적이고 소형 중심의 집 형식은 1 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타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에게는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취업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대학가의 주거난을 대학생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거환경을 개발할 수 있는 창업의 기회를 대학생들에게 주고 지원을 해준다면 취업난과 주거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대학과 손잡고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 학생들이 캠퍼스 밖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주거난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진행하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무 · 주거 혼합형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1 인 가구 중심의 새로운 집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한다면 청년의 주택난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⑥ 김효정(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우리 경제의 어려움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출부진과 함께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가져온 후폭풍이 저유가로 연결되면서 조선 해운 산업이 된서리를 맞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자영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 내의 난제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내수 전반과 자영업 가계부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06 차 월례 토론회를 22 일 오전 명동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발제자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부문은 건설투자이며, 이중 특히 주택건설부문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분양물량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일부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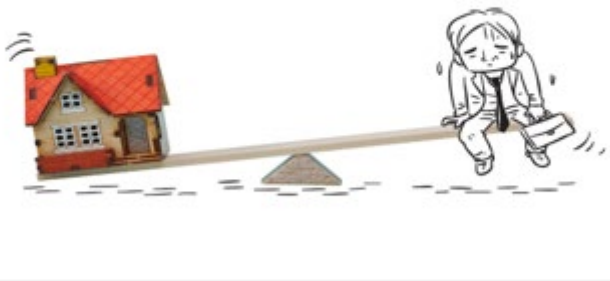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5 년도의 주택착공물량이 70 만호 수준이고 금년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여서 2017 년도 말에서 2018 년도에 걸쳐 준공되는 아파트 등 공급물량 소화 능력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2007 년

미국(99.9%)에 육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날 토론자로 참석한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를 지적하며 “저금리 환경의 지속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상품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건설수주가 감소하게 되면 건설산업과 연관산업이 어려워지고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이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금융리스크관리와 주거불안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리스크관리와 주거불안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의 주택시장은 과거 침체기를 탈출하면서 시장에서 보이는 일부의 과열현상으로 다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시장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는 경우 신속히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시장원리의 작동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선진화에 역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선진화를 위해 리스크와 리스크 프리미엄(금리)의 관계를 일정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는 상응하는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낮은 투자에는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백성준 교수는 “특히 주택의 개념이 주택소유에서 거주로,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어 부동산금융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을 벗어야 할 것이 많다”고 첨언했습니다.

즉, 현재 부동산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지만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대부분의 주택소유자들은 부채를 통해 주택을 거래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이나 취약계층은 더더욱 주거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정책인 행복주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는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층이 80% 입주하게 되고 나머지 20%는 노인•취약계층에게 공급을 하며 2017 년까지 총 15 만호(사업승인 기준)가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 세 전월세 세입자중 직장생활 5 년 미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혼자사는 사회초년생 525 명 중 89.7 퍼센트가 행복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 82.6 퍼센트가 저렴한 임대료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체 설문대상 중 51 퍼센트가 가장 중요한 주거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공공임대 주택 확대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행복주택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입주 자격이 까다롭고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보다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혹은 '취약 계층'인 대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은 수의 젊은이들이 중복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많은 부동산 물량들을 행복주택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보급한다면 젊은이들의 부채를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채비율의 감소, 부동산 선진화로 가는 관문입니다.

⑦ 유선호(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가계부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9 월 22 일에 한국선진화포럼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명동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제 106 차 월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의 발제자인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위원은 건설 투자 중 특히 주택건설 부문에서의 경제성장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볼 때 분양물량의 과잉공급이 얼마나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15 년도의 주택착공물량이 70 만호 수준이고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여력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공급물량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위태롭다는 것도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내 부동산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하향조정한 결정이 기대했던 바처럼 가계의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상품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험을 인지해야 하며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러한 우려는 과거 침체기로부터 갓 벗어난 부동산주택시장의 일시적 과열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기능을 믿고 맡겨 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기능이 정상 작동될 것이고 주택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의 어떠한 개입도 오히려 주택시장의 선진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주택수급 문제에 정부가 직접개입해서 가계부채 비율을 감소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원리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러한 위험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선진화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개념이 바뀜에 따라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와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에 일정한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도록,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에 발생하는 프리미엄은 낮게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초점도 주택소유의 문제에서 거주의 문제로,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어 가는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주택 및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하지만 주택시장의 과열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주거비를 낮추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LTV, DTI, 분양권전매제한 등 핵심규제를 적절하게 조정해 가면서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여우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⑧ 이권식(한양대학교 경제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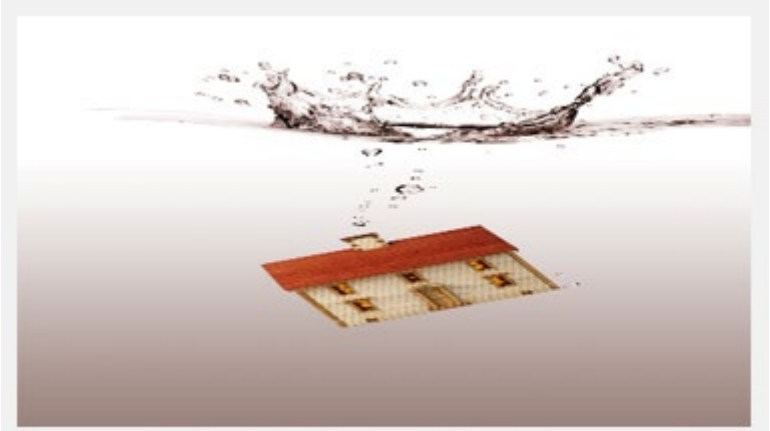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주요 40 여개국 가운데 3 번째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가계부채의 총량 역시 1300 조원에 육박합니다.

더불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1300 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뇌관이 터져 한국 경제를 짓누를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국가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 선진화 포럼은 지난 9 월 22 일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 위험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 106 차 월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을 향한 부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제자인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분양물량 및 가속화되는 생산가능인구 추계 감소 속도 등 일부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 연구위원은 경제성장 달성에 건설투자의 역할이 크지만 내년 상황을 쉽게 예단할 수 없으며, 높은 잔액과 빠른 증가세 그리고 부채 질의 악화라는 3 가지 문제를 지닌 가계부채 문제 및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선 리스크와 리스크프리미엄(금리)의 관계를 일정한 기준으로 통일해야 하며, 투자목적과 실수요 목적에 따른 대출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건설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나선다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반면,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 시장원리의 작동을 어렵게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선진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며, 국가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 현 상황에서 시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주택은 사유재이면서 공공재이고,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 복합산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라는 것은 사유재이면서 동시에 공공재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요인 외에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 복합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 또는 국가에서 주택은 정부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며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정부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당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주택은 주거의 대상보다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기에, 이러한 투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기에,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며, 시장참여자나 국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조성할 경우, 시장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시장원리에 근거하지 않은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함으로 인해, 2013 년에 시행된 4.1 종합 부동산 대책부터 2016 년에 시행된 8.25 가계부채 대책까지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전세값 폭등, 월세가 급증하여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는 갈수록 쪼그라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공급을 제한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던 정부의 8.25 가계부책 대책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오히려 주택시장에 불을 지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가 가계 부채를 잡겠다며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을 줄이겠다고 공언하자, 역으로 매도자들이 신규 분양물량에 대해 호가를 높이거나 매도를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가격을 왜곡시키고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관련 취득세 인하와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 공급,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주거비를 낮춰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문제 해결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지원이라 함은 임대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부동산 펀드와 리츠(REIT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리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시장이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리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의 과도한 자산 비중을 축소해 금융 자산형태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소위 말하는 '고령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압박'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비 리츠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볼 때, 리츠 활성화가 주택 가격을 방어해줄 것이란 예상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리츠의 수익률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로 인해 한 단계 발전된 국내 금융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에 혼선을 안겨주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 정책만이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⑨ 이효은(건양대학교 글로벌마케팅학과)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속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세계의 경제 중심부에서 시작된 실물경기 침체 파장이 신흥경제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가 최선의 정책으로 대응한다 해도 외부의 경제 환경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난국을 독자적으로 헤쳐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위기가 부동산시장의 버블(bubble) 붕괴에 의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변화추이 및 제도개선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9 월 22 일 오전 명동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 106 차 월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부문은 건설투자이며, 이중 특히 주택건설부문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분양물량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일부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2015 년도의 주택착공물량이 75 만호 수준이고 금년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여서 2017 년도 말에서 2018 년도에 걸쳐 준공되는 아파트 등 공급물량 소화 능력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2007 년 미국(99.9%)에 육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리스크관리와 주거불안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같은 날 토론자로 참석한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를 지적하며 “저금리 환경의 지속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상품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건설수주가 감소하게 되면 건설산업과 연관산업이 어려워지고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이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금융리스크관리와 주거불안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의 주택시장은 과거 침체기를 탈출하면서 시장에서 보이는 일부의 과열현상으로 다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시장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는 경우 신속히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시장원리의 작동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선진화에 역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선진화를 위해 리스크와 리스크 프리미엄(금리)의 관계를 일정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는 상응하는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낮은 투자에는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백성준 교수는 “특히 주택의 개념이 주택소유에서 거주로,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어 부동산금융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을 벗어야 할 것이 많다”고 첨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택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공급과잉의 부드러운 해소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과잉 공급된 주택재고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통해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에 만연해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공공택지공급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급은 주로 공공의 택지공급과 민간기업의 주택건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민간기업에서 미분양이라는 재고를 부담하면서까지 민간택지에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은 정부에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공인데요,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시기에 공공마저 주택공급을 늘리면 민간의 재고부담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유연한 자세로 공공의 택지공급을 관리해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현재 과도하게 공급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을 공공임대리츠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문제 해소에 나선다면 공공임대주택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유연한 공급 통제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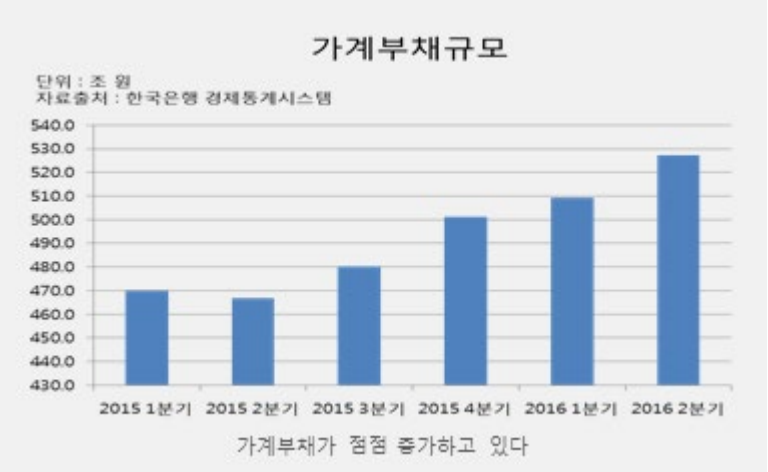
민간에서는 미분양 재고 부담으로 인해 공공 임대리츠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게 될 것이며 공공 임대리츠는 민간자본에 대해 충분한 수익을 주면서도 임대료나 관리비를 낮게 유지할 수 있어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성수 교수가 주장하였듯이 인위적인 주택 공급의 감소는 오히려 부동산 버블을 초래하는 등 시장원리의 작동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인위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시장원리에 맡기고 지켜봐야 하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절벽과 저성장 등으로 인한 주택소유에 대한 수요 감소는 주택경기순환주기 상 공급과잉이 지속적인 시장수요로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친 통제는 시장원리의 작동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선진화에 역행을 초래할 수 있지만, 생산가능인구의 저하와 저성장 문제에 마주친 현재 정부의 간섭은 불가피합니다. 정부의 유연한 공급 통제로 주택시장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⑩ 장정욱(경기대학교 경영학과)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며, 설상가상으로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와 부채의 질 하락이라는 3 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투자가 경기부양의 중심이 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9 월 22 일 월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로 참여한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현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부문은 건설투자이며, 이중 특히 주택건설부문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신규로 준공되는 아파트 등 공급물량 소화 능력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일부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2007 년 미국(99.9%)에 육박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토론자인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를 지적하며 "저금리 환경의 지속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상품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리스크 관리와 주거불안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 건설수주가 감소하게 되면 건설산업과 연관산업이 어려워지고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이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의 주택시장은 과거 침체기를 탈출하면서 시장에서 보이는 일부의 과열현상으로 다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시장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는 경우 신속히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시장원리의 작동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선진화에 역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선진화를 위해 리스크와 리스크 프리미엄의 관계를 일정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는 상응하는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낮은 투자에는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의 개념이 주택소유에서 거주로,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어 부동산금융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주택시장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주택의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시장의 왜곡을 일으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감소는 오히려 부동산 버블이 생길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한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공급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기보다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백성준 교수의 지적처럼, 시장이 원활이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선분양 방식을 후분양 방식으로 점차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입주시점의 경기 상황보다는 선분양 시점의 열기를 기준으로 구입 여부를 판단해 시장 변동폭을 지나치게 키우는데다, 구매하려는 주택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고 모델하우스를 통해 대략적으로만 가늠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계부채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LTV 와 DTI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고, 투기심리로 인한 지나친 부동산 과열도 경계해야 합니다.

시장 원리에 따른 대책과 미시적인 가계부채 정책이 조화를 이룰 때 부동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⑪ 전도훈(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연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청약 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과도하게 쏟아지면서 공급 과잉 논란이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가계 부채 대책 등에 따른 주택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 부채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8.25 대책의 주요 의미는 주택공급량의 급격한 침체를 막고 적절한 공급량 조절로 가계 부채를 규제해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가계 부채 대책은 장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대지 공급을 줄이고 투기 수요/가수요는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가계 부채 대책 최초로 주택 공급 관리를 포함했기 때문에 일견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는 중도금 대출 증가를 압박하는 대책입니다. 아파트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격인 오피스텔 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주요 대책 중 하나가 10 월 부터 1 인당 중도금 최대 보증 건수를 4 건에서 2 건으로 줄였기 때문에, 분양 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또한, LH 가 택지 공급을 줄이게 되면 주로 택지를 공급 받아 아파트를 공급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 수주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사보다 공공택지 분양을 중심으로 중소형 건설사들이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택지 공급이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이미 공급된 택지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더 치솟을 가능성도 큽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가 내세운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할 뿐 더러 오히려 양극화 현상의 초래와 부동산 시장의 열기만 북돋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재)한국선진화포럼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제 106 차 월례 토론회를 이번 달 22 일 오전 명동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발제자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부문은 건설투자이며, 이중 특히 주택건설부문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분양물량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일부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잉 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어 “2015 년도의 주택착공물량이 70 만호 수준이고 금년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여서 2017 년도 말에서 2018 년도에 걸쳐 준공되는 아파트 등 공급물량 소화 능력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2007 년 미국(99.9%)에 육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날 토론자로 참석한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를 지적하며 “저금리 환경의 지속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상품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건설수주가 감소하게 되면 건설산업과 연관산업이 어려워지고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이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금융리스크관리와 주거불안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의 주택시장은 과거 침체기를 탈출하면서 시장에서 보이는 일부의 과열현상으로 다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시장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는 경우 신속히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시장원리의 작동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선진화에 역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선진화를 위해 리스크와 리스크 프리미엄(금리)의 관계를 일정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는 상응하는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낮은 투자에는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백 교수는 “특히 주택의 개념이 주택소유에서 거주로,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어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을 벗어야 할 것이 많다”고 첨언했습니다.



1인 1부동산 정책을 제안한다!

해법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해법의 골자는 과잉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517:1 이라는 경이로운 청약 경쟁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1 인 1 부동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물론 존재할 수는 있지만, 주택 공급이 다소 부족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기가 개인의 이익 증진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 금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지방 부동산과 수도권 부동산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 1 인 1 부동산 정책의 골자와 내용에 대한 홍보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⑫ 정영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부동산문제는 국가경제전체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하여 정부의 8.25 대책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고육직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인데요.

집단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1 인당 중도금 보증 건수를 4 건에서 2 건으로 제한하고, 중도금을 부분보증으로 전환하여 은행이 대출의 10%에 대해서 리스크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공급의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LH 공사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가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내수전반과 자영업, 가계부채 문제와 밀접하여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미진한 상황에서, 여타 우리의 주요 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부동산 경기가 경제성장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 106 차 월례토론회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올해와 내년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주택공급 과잉이 우려됩니다

송인호 발제자는 분양물량이 예상을 상회하는 등 주택공급증가세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으로 우려하였습니다. 부동산 건설투자 주택부분이 작년 하반기 이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토목부분의 부진도 크게 완화되면서 건설투자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에서 절반이상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건설투자가 견인하는 경제성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경제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증가세가 장기적인 경제 트렌드로 자리잡아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부동산시장 붕괴로 인한 장기경제침체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는데요.

고령화로 인한 1 인가구의 증가세로 주택처분이 늘면서 오히려 주택수요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가 장기경제침체를 극복하는데 발목을 잡았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독일과 같이 신축적인 주택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허윤경 토론자는 2016 년 2.7% 경제성장 달성에 건설투자가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나 내년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건설투자상황이 향후 녹록치 않으나, 2017 년 2.9%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건설투자부분의 3%증가세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토론자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건설투자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연착륙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전환하면서 건설투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문제를 지적하면서 부채액의 절대규모가 크고, 증가세는 작년과 올해 들어 급등하고 있으며,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한편, 분양시장과 재고시장,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지역간에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건설과 연관된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금융 리스크의 현실화, 매매시장의 미분양, 미입주 문제를 향후의 부동산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성수 토론자는 주택공급증가를 오랜 침체후에 최근 2 여년간 주택매매시장이 회복됨에 따른 경기순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오히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의 작동을 저해하고 부동산 시장 선진화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성수 토론자는 현재의 건설투자 주도형 경제에 대한 발제자의 우려에 대해 일본 부동산 버블기와의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의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보다 건설투자비중이 높았던 시기도 많았으며, 현재도 다른 여타 산업들이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건설투자부분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버블기에 투자가 집중된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부분은 다른 위험도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부분에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준 토론자는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습니다. 첫번째는 리스크와 리스크프리미엄간에 명확한 리턴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금리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요구하며, 대표적으로 시장의 변동폭을 키웠던 선분양방식을 지적하고 부동산 금융이 성숙함에 따라 후분양방식으로 전환하면 탄력적인 공급조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소유자 중심의 세제제도를 지적하면서 고액전세자의 세제 부담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자들은 금년과 내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리스크요인, 부동산 시장 선진화 방안을주제로 열띤 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일반국민들의 주거문제, 가계부채문제 등 국민들의 실제 삶과 크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관련 논의 및 정책들은 국민들의 실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잘 와 닿지 않는 실정인데요.

거시경제 차원에서만 부동산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실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안의 하나로 지자체가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국지적인 성격이 큰 문제입니다. 경제전체의 흐름속에서도 각 지역마다 각각의 독특한 이슈들과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거시경제 전체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이것이 지역의 부동산 문제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각 지자체마다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지자체 컨설팅을 전담하는 부동산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각 지자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협업하여 지역의 고유한 부동산 이슈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⑬ 최상연(한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부동산 시장도 뉴노멀시대 속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뉴노멀시대가 전세계적으로 도래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출부진과 함께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가져온 후폭풍이 저유가로 연결되면서, 한국의 주산업인 조선 해운 산업도 큰 타격을 맞으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영란법이 발효되며 식당과 같은 자영업에도 전국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 난제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도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내수 전반과 자영업 가계부채 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많은 관심과 우려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9 월 22 일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제 106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제로 나선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GDP 대비 건설투자의 증가와 미분양주택 수의 증가를 강조하며, 전국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거래량 하락과 전월세 가격 전년동기대비 완만한 상승세를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빠른 증가속도와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8,4%에 육박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악화된 한국 주거환경에 대한 발제자의 설명에 동의하지만, 현재 주택시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를 벗어나는 과정 중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경제상황이 회복된다면 신속히 해결될 것이기에 정부가 시장을 거스르고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반론하였습니다.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는 기준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화두로 리스크와 금리의 관계를 일정한 기준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리스크가 큰 투자일수록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해 리스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정확히 매치하는 통일된 금리를 적용시켜 부동산 시장내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내에서 목적에 따른 대출의 구분화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건설투자의 절대적인 역할을 언급하면서 계속되는 가계부채 문제에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차별화를 꼬집으며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만 집중된 수익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택난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설립을 제안합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악화된 한국 주택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현재,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주택은 인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국의 인구가 고령화, 저출산의 길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새로운 주거형태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의 형태와 관련 산업들의 방향성 또한 바꿔야 저성장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는 지역 공동체 입니다. 쉐어하우스처럼 단순히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데서 벗어나 많은 이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주민은 그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는 노인들이 될 수도 있고, 주거 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대학생이 될 수 도 있습니다. 1 인가구와 핵가족이 늘고 있는 만큼, 인구 밀집이 높은 수도권에 지역 공동체를 개설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새로 건물을 짓기보다는 현재 주택 과잉 공급이 대두되고 있기에, 미분양 된 아파트나 재개발이 필요한 주택을 개조한 지역공동체 설립을 제안합니다. 지역 공동체는 교류가 중요하기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 위주로 공동체 설립을 우선시하며, 인구 밀집 지역의 주거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공동체 의식 회복에도 도움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역공동체는 마음이 맞는 이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디자인 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식당과 문화 공간과 같은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며 함께 교류하는 장,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리를 해서 나누어 먹고, 마을 사진 전시회를 열고, 미니콘서트도 열면서 학생들 또한 기숙사와 같은 딱딱한 공간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타지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별로 다양한 특색을 나타내기에, 관광산업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다양한 이가 모여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기에 이는 공동체 의식을 체계적으로 회복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주거 형태인 지역 공동체는 단순히 집을 공유 하는데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거난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통해 부동산 선진화와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입니다.

⑭ 하성수(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더딘 가운데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과 함께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가져온 후폭풍이 저유가로 연결되면서 조선 해운 산업이 된서리를 맞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 내의 난제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내수 전반과 자영업 가계부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 한국선진화 포럼은 9 월 22 일(목)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빌딩 2 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106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분양 물량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일부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5 년도의 주택착공 물량이 70 만 호 수준이고 금년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2017 년도 말에서 2018 년도에 걸쳐 준공되는 아파트 등 공급물량 소화 능력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2007 년 미국(99.9%)에 육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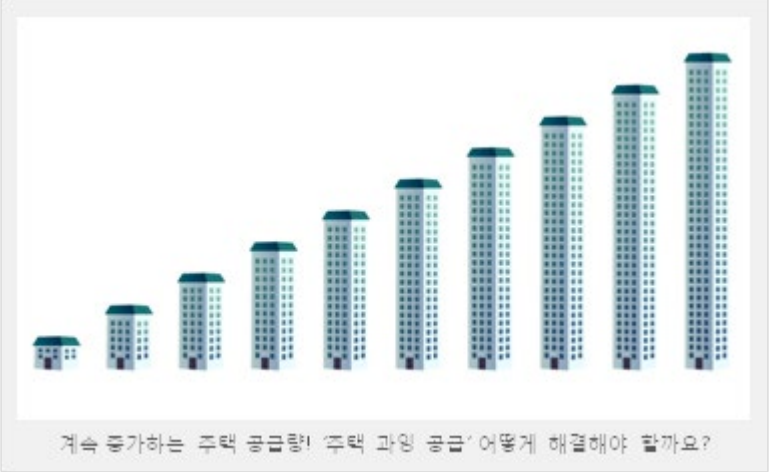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의 주택시장은 과거 침체기를 탈출하면서 시장에서 보이는 일부의 과열 현상으로 다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시장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는 경우 신속히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시장원리의 작동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선진화에 역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간 19 만~35 만 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2015 년의 75 만 호 주택 건설 실적은 수요 대비 매우 높은 공급인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롤러코스터의 정점 꼭대기에 올려 놓은 기차 머리'로 비유해 입주시점인 2~3 년 후 시장의 위기를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를 지적하며 “저금리 환경의 지속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상품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건설 수주가 감소하게 되면 건설산업과 연관산업이 어려워지고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금융리스크 관리와 주거불안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주택 공급량! '주택 과잉 공급'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분양 물량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5 년의 75 만호 주택건설실적은 연간 적정 수요량인 35 만호의 2 배가 넘는 물량으로 입주시점인 2017 년, 2018 년의 부동산 시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의 환경 속에서 건설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공급 증가세도 2~3 년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분양 후 입주시점인 2~3 년 후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과잉공급을 유발하며, 생산 가능인구 즉,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넘어 한국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지방'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수요가 유지되나 대구, 광주와 같은 광역시와 기타 지방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만들지 못해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셰어 하우스'로 청년 주거문제와 노인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셰어 하우스(share house)'에서 찾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생활하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은 고시원, 고시텔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셰어 하우스'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월세를 분담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며 동시에 주택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와 건설사의 지원으로 노인빈곤층을 대상으로 '셰어 하우스'를 운영하며 관리, 보호 역할의 사회 복지사를 배치하여 노인 자살률을 줄이며 우울증, 기타 질병 등의 노인문제를 줄이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 법과 정책을 제정하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셰어 하우스'를 통해 주택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며, 부동산 시장과 건설부문의 성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청년 주거 문제와 노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2차 선진화 연구모임

조선희(고려대 식품자원경제 3) : 지금부터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 월, 한국선진화포럼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위험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06 차 월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이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세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도 '주'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문제와 주택공급과잉 해소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 본업인 학업에 온전히 몰두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리사회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SH 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임대주택제도'와 LH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전세자금대출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난과 주택의 공급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의 규모를 확장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집을 구하고 싶어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벅차기만 한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제도들을 운영한다면 시장에 나와있는 주택들이 이들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정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하지만 저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제 동생이 올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청년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었지만 집주인들이 LH 전세를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월세를 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 집주인들은 전세를 손해로 생각하고 있고, LH 와 계약할 때 주택관련 부채상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LH 와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맺는 특성상 계약과정이 까다로울 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까다롭고,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내놓는 대신에 집주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소유와 관련된 세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조선희(고려대 식품자원경제 3) : 좋은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현재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기존 입주민들이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해, 행복주택지구가 다시 해제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LH 주택공사 대학생전세자금대출과 행복대출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정웅 학우가 인센티브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지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추가로 공원이나 도서관 등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여러 시설들을 지원해준다면 주민들의 반발도 어느 정도 사그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현민(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 위 제도들도 좋지만, 저는 일단 대학생들의 주거는 학교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학교 인근 주민들과 학교 측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게 만드는 입대업자간의 담합을 막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만드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대학교마다 정원의 20%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필수로 확보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는 기숙사를 새로 지으려고 했지만 인근 주민의 반대로 몇 년째 보류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률안으로 규제를 만든다면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정자현(고려대 식품자원경제 4) :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주민들과 임대업자들이 왜 각각의 정책들에 대해 반대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주택을 투기, 수익 내기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마구잡이로 구입하고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공급과잉과 청년 주거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구입을 투기목적과 실 거주 목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옳지만, 주거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추가로 더 지불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선행되어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희(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3) : 지금까지는 현재 청년들의 주거난과 주택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과 그 한계점,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외에 또다른 해결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세요.

차준용(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2) : 주택은 한 번 공급된 이후에 시장 수요에 맞게 구조를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 공급된 주택을 시장 수요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하나의 주택에 한 가구만 산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럿이서 함께 주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인근 벽산아파트에는 실제로 여학생 여럿이 모여 임대료를 나누어 내고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제 친구도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임대료 부담은 원룸보다 적고 치안도 훨씬 좋으면서 주택의 질도 보장되어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급과잉으로 인해 미분양 주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미분양 주택들을 이렇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우스쉐어링으로 독거노인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권원중(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2) : 차준용 학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생들끼리 하우스 메이트를 구해서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독거노인들과 대학생들을 연계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청년들과 노인계층이 서로 소통하면서 세대 간 화합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정책들이 도입 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정부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지방에서 자랐고 현재 제 가족들이 모두 지방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주택문제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서울 외에 지방의 주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현민(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 2) : 아무래도 지방에 비해 서울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점들로 인해 사람들은 계속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의 미분양주택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인근 지역들은 앞서 우리가 논의한 내용들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외의 지역들에는 조금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 3) : 최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국책연구소들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방 소재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 형식으로 주택 자금을 일부 지원해 준다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민(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 2) : 좋은 생각입니다. 일례로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에서 수도권까지 KTX 등 여러 교통수단이 준비되어 있어서 세종시에서 일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고 서울에서 통근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서울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상 지방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방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조선희(고려대 식품자원경제 3)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택과잉공급과 청년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 해 보았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의 보완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새롭게 도입되었으면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현재 LH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전세자금대출제도는 임대업자들의 반발이 심하니 임대업자들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 이와 같은 논리로 행복주택 사업에도 사업구간 인근 주민들에게 공공시설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대학들에게 최소 기숙사 수용인원 하한제를 적용하여 정원의 20%이상을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 대학 차원에서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임대료 가격 담합을 막을 것 등의 제안도 있었으며 하나의 집을 한 가정이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럿이 함께 주택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소재 대학 인근 지역에는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학생 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고, 이외의 지역에는 최근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이나 국책연구소의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의 형태로 임대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주거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하루 빨리 청년 주거난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윤다영(산업인력 2): 안녕하십니까?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농업생명과학대학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수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가계부채가 불어나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이와 직결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는 지역 간의 양극화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주택 공급량을 만족시킬 만큼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 성남시와 같은 위성도시에서는 서울과의 교통 편의성을 강점으로 주택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이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데 과잉공급으로 인해 주택이 남아돌고 있죠.

지방에 대한 주택 규제만으로는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방 학사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지방의 건설사가 서울에 지방 학생들을 위한 학사를 지어줌으로써 지방의 건설사는 수도권에 공급을 하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들은 학사에서 질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지방 학사 건립"이라는 해소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더 나아가 또 다른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함께 토론해보려 합니다. 좋은 토론을 위해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 학사의 건립이 수도권의 수요와 지방의 공급을 합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화련(바이오소재 2): 제가 지금 지방 학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는 질적으로도 매우 만족하고 같은 지역에서 온 학우들과 함께하니 더 큰 유대감이 형성된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학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 건설사와 학생들 간의 수요를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합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란경(식물생산 1): 지방 학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 뿐 아니라 사회초년생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시행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주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일자리 찾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더 넓어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욱(식품공학 1):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지방이 사회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을까요? 지방 학사의 건립처럼 지방의 건설사가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전략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극화를 정말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시, 지방혁신도시의 건설처럼 결국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죠.



지방도 발전하는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노길호(바이오소재 1): 수도권과 가까이 있는 세종특별시나, 지방혁신도시들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수도권에서 셔틀버스, KTX 등의 빠르고 편리해진 교통수단을 통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단순히 정부 청사의 이전만이 지방의 주택 수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먼저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지역, 여가 공간이 잘 조성된 지역, 핵심 산업이 밀집된 지역 등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진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시설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김하경(원예 2): 저 또한 비슷합니다. 비단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부동산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공급보다 수요가 앞선 곳도 있죠.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곳과 얼어붙은 곳이 극명히 나뉘며 지속적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사들이 자신들이 지은 주택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원, 도서관 등 주택 단지 내에 여가, 문화 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거 시설에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공원, 헬스장, 도서관 등에서 휴식과 함께 여가의 역할까지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건설사들이 주택 그 자체 뿐 아니라 다른 시설들에 신경쓴다면 그들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 공간에서 여가 공간으로 변화해 주택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윤다영(산업인력 2): 지방에서의 부동산 시장 수요 창출을 이끌어내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거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들, 사회초년생들에게 다시 집중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방 학사 건립”처럼 지방의 부동산 수요 문제 해결, 수도권 거주 문제 해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화련(바이오소재 2): 부동산 열기가 과열된 수도권과 열기가 얼어붙은 지방에서의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한 의견이 매우 엇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그 예시인데요.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서 여신심사의 강화를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아파트 신규 분양을 줄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수요가 적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는 미분양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분양 축소는 수도권의 재건축 수요를 키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서민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행복주택과 같은 주거복지사업, 공공복지사업 등에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 사회초년생,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란경(식물생산 1): 수도권 대학생들과 지방 건설사가 연계해 지방 학사를 건립했으니 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건설사가 협력해 공급이 남는 주택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두의 하우스"는 아파트에 6 명의 학우들이 모여 사는 구조인데, 치안도 안전하고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학생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학교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한다면 대학생들과 건설사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와 수도권의 건설사가 연계해 주거 공간을 제공해준다면 수도권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신입사원들을 위해 복지를 제공하고 사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주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애사심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윤다영(산업인력 2):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전부 잘 들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현황과 전망을 분석했던 106 차 월례토론회로부터 나온 부동산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유익한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 부동산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 학사의 건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에 있는 주택시설에 공원과 도서관 등을 도입해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시장의 경제 원리에 맡기고 서민을 위한 주거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 수도권의 대학, 회사들과 건설사가 연계해 수도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통해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수도권, 그에 비해 얼어붙어 있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 격차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주거 문제 해소, 지방의 주택 수요 창출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③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2차 선진화 연구모임

이권식(한양대 경제 4) : 지금부터 제 2 차 한양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 월 한국선진화포럼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 위험요인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제 106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주요 40 여개국 가운데 3 번째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가계부채의 총량 역시 1300 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1300 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뇌관이 터져 한국 경제를 짓누를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지만, 시장원리에 근거하지 않은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혼선만을 가중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보다 시장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가계부채에서 시발되는 부동산 시장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주거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리츠(REITs, 부동산전문신탁)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조동수(한양대 기계 4) : 청년 주거 빈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들의 소득 증가 속도보다 주택 가격 혹은 임대료 상승 속도가 더 빠른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주택 가격 혹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 노멀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각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제는 현재 세대의 고통을 미래 세대에 전이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찬혁(한양대 경영 4) :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보증금과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셰어하우스(Share House)에 거주하길 원하는 학생과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셰어하우스 포털 '컴앤스테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 남녀 10 명 중 6 명은 '셰어하우스에 살아보고 싶다' 또는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임대인에게도 셰어하우스는 방마다 월세를 받을 수 있어 기존 월세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셰어하우스가 현재의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혜린(한양대 프랑스언어문화 2) : 저는 조동수 학우의 의견과는 달리, 정부가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이 현재의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제안한 청년활동수당 혹은 프랑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로까시옹(allocation)이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청년 수당이 장기적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청년활동수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형편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청년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활동과 자기개발에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계층의 이동이 없는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이들이 안정적인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사회 안전망의 확대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기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활동수당이 청년들의 자립심을 헤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50 만원이라는 금액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큼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물론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검증 절차를 거쳐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선별해 청년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년활동수당은 결코 허투루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수당을 받게 되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렸지만, 해외에서도 청년활동수당과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알로까시옹을 지급하고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독일, 호주 등 많은 선진국에서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고용확대 및 청년복지로 이어져 장기적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동수(한양대 기계 4) : 최혜린 학우의 의견이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청년활동수당 혹은 알로까시옹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포퓰리즘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의 재원이 최소한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참여형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권식 학우가 제안해주신 리츠(REITs)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이며, 민간참여형 주택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이며,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리츠의 특징은 주식처럼 100 만 원, 200 만 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증권화가 가능하여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실문자산에 투자하여 가격이 안정적이며, 그렇기에 가치상승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찬혁(한양대 경영 4) : 저는 민간참여형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크라우드 펀딩이란 군중을 뜻하는 '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Funding'을 합성한 단어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법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임대주택 혹은 셰어 하우스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합니다. 청년들은 저렴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 혹은 셰어 하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년 가구의 주택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 혹은 셰어 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직까지 주택공급보다 청년들의 주택수요가 많은 상황임으로, 해당 주택은 낮은 공실률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크라우드 펀딩이 주거난으로 인한 청년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제안된 것이므로,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담보할 순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고채에 투자한 것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투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참여형 주택시장의 활성화 역시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혜린(한양대 프랑스언어문화 2) : 신찬혁 학우가 말씀해주신 민간참여형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다는 의견이 무척 신선했습니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성된 임대주택 혹은 셰어 하우스는 기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렴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와 기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간에 발발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저렴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최근 주택을 구매 혹은 임대하는 청년들에게는 높은 주택 가격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취득세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관련취득세를 인하하는 것도 청년들이 지고 있는 어깨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지(한양대 프랑스언어문화 4) : 우선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를 통해 투자자와 임대수입자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해당 갈등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비용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당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렴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고채 수익률에 근거하여 해당 가격을 산출한다면, 청년에게는 저렴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수익률은 다소 낮을지 몰라도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참여형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단순 투자상품으로 그치는 것보다, 개인 차원에서 공유가치(CSV)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 해당 크라우드 펀딩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 광고 제작 등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국가 도약! 청년주택 문제 해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권식(한양대 경제 4) : 지금까지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오늘 토론에 임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발언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특성에서 기인하여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알로까시옹, 크라우드 펀딩 활용, 리츠(REITs)까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오늘 제시해주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시해주신 의견은 일정부분 보완을 거친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2 차 한양대학교 선진화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④ 한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국내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며 많은 이들이 주거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상연(한동대 컴공 2): 제 2 차 선진화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9 월 한국선진화포럼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106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뉴노멀시대가 전세계적으로 도래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저성장의 늪에서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람의 의식주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내수 전반과 자영업 가계부채 등 다양한 경제 문제와 관계되어 있기에 많은 관심과 우려가 몰리고 있습니다.

주택은 과잉공급 되고있는 한편, 주거난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지역 공동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방식을 제안합니다. 쉐어하우스와 같이 단순히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데서 벗어나 많은 이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해결하는 주거문제“ 라는 소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또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자유롭게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한동대 심리 3): 지역 공동체가 기존의 쉐어하우스와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친구가 서울에서 거주하기 위해 쉐어하우스를 알아 보았습니다.

쉐어하우스 전문 사업을 통해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사진과 다른 경우도 많고, 구성원들과 공통된 관심사나 교류가 없는 편이어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과연 지역 공동체가 주거난도 해결하고 공동체로 발전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최상연(한동대 컴공 2): 제가 생각하는 지역 공동체는 마음이 맞는 이들이 모여 작은 규칙이나 문화 시설들을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디자인 해 나가는 공동체의 형태입니다. 함께 교류하는 장,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타지에서 온 이들이 부담없이 주거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과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 별로 다양한 특색을 나타내기에, 관광 산업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을 전체가 벽화가 그려져 있는 벽화 마을은 대표적인 관광마을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히 집을 공유하는 데서 벗어나 주거문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장주선(한동대 국제 4): 최상연 학우가 제안한 지역 공동체에 대해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키부츠라는 농업공동체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이 공동체는 밭농사부터 생산 등 공동생활체로 다양한 규모의 멤버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며, 교육, 주거와 같은 삶의 기본요소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운타운 프로젝트도 이와 비슷한 방식이며, 이러한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로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같은 생활 공간에서 협업하는 삶을 모색하고, 삶의 기본요소 보장을 지향하기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시된 지역 공동체는 현 부동산 문제에서 비롯된 거주난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생활권이 보장 될 수 있다면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역 공동체는 거주난을 겪는 대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을 도와줍니다.

황현정(한동대 제품디자인 2): 앞서 언급된 지역 공동체에 대해 동의하기에 조금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거주문제를 겪는 이들의 상당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 과잉 공급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현 부동산 시장은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된 아파트나 주택을 회사와 학교가 계약을 맺어서 사원들과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기숙사와 같은 형태로 늘린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을 가진 이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기존의 기숙사와 비교하였을 때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이 수월해 질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거주하는 곳에서 벗어나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문화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류를 쌓아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교(한동대 생명 2): 황현정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학교와 같은 경우 학생 전원 기숙사 입주를 지향하며 학교의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은 각 호관의 학우들과 교류를 맺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아갑니다.

영화감상, 체육대회, 팀 바베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서 관계를 쌓아가기에 타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대학교에 기숙사 건설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과잉 공급 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현재 겪고 있는 주택문제과 거주난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준규(한동대 생명 2): 앞선 학우분들의 의견에 동감하며 저는 기숙사와 더불어 LH 주택공사 전세자금대출사업과 같은 지원도 수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집구하기에 어려움이 적은 지방 거주 학생들은 LH 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은 한편, 수도권 학생들은 선발이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내어놓은 조건과 지원금이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 받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따라서 많은 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수요별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연(한동대 컴공 2): 어려운 주제에 잘 참여해 주셔서 모두들 감사합니다. 이번 선진화연구모임에서는 월례토론회 주제인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우리 주변 대학생들과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문제와 연결 지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공동체를 통해 주거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주택 과잉 공급 문제도 해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와 정부의 지원이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위기에서 비롯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겪는 이들을 위해 부동산문제와 주거문제가 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 차 선진화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제안하는 부동산 선진화 실천 방안

김효정(이화여대 경영 1)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9 월 22 일 목요일 오전 7 시에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 위험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 106 차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내수 경기의 불황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부동산 공급과,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 가계 부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8 년의 금융위기를 되풀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행복 주택의 확대 보급을 제안합니다!

배세린(이화여대 경영 1) : 동의합니다. 요즘 신림동 고시촌에 고시생들보다는 신혼부부가 더 많이 산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부담되는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을 위한 행복주택의 확대는 이러한 계층의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빈(이화여대 경영 1) : 제가 올해 초에 신촌과 이대 근처의 자취방을 알아보았었는데 월세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고 그렇다고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도 아니라 살 곳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특히 지방에서 온 대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행복주택의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수림(이화여대 경영 1) : 하지만 행복주택을 확대하는 사업은 정부의 예산에 없는 지출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건설사 주도의 쉐어하우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이화여대 경영 1) : 동의합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가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민경(이화여대 경영 1) :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사업 보다는 민간 기업 주도의 쉐어하우스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않는 청년들에게는 독립된 공간과 공유 공간을 함께 포함하는 쉐어하우스가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해주지 않을까요?



쉐어 하우스의 확대와 보편화가 시급합니다!

김지인(이화여대 경영 1) : 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서만 이런 사업들을 실시한다면 저렴한 가격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이든 쉐어하우스든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연(이화여대 경영 1) : 물론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 같은 1 인 가구에게는 쉐어하우스가 좋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나 노년부부에게는 쉐어하우스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인 이상 가구는 독립된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행복주택의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서진(이화여대 경영 1) :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초과 공급된 부동산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에서 미분양 물량들을 싼값에 사들여 행복주택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인의 입장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것보다는 싼값으로라도 파는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호원(이화여대 경영 1) : 행복주택의 확대와 쉐어하우스 보급 확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거지로 지어진 건물을 꼭 주거지로만 활용해야 할까요? 저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진희(이화여대 경영 1) : 강남의 한 청년창업자는 한 노년부부가 살던 단독주택을 개조해 빈티지한 느낌의 카페로 재탄생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카페와는 다른 분위기에 수입이 좋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거 공간을 문화 공간이나 쇼핑 공간처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정(이화여대 경영 1) : 오늘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들여 행복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민간 사업자의 쉐어하우스 보급 확대와 쉐어하우스의 보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거지를 주거 공간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업 시설, 문화 시설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⑥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부동산 선진화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유선호(서강경영 1) :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2 차 서강대학교 학생들의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9 월 한국선진화포럼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위험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06 차 월례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뉴노멀 시대에서 한국의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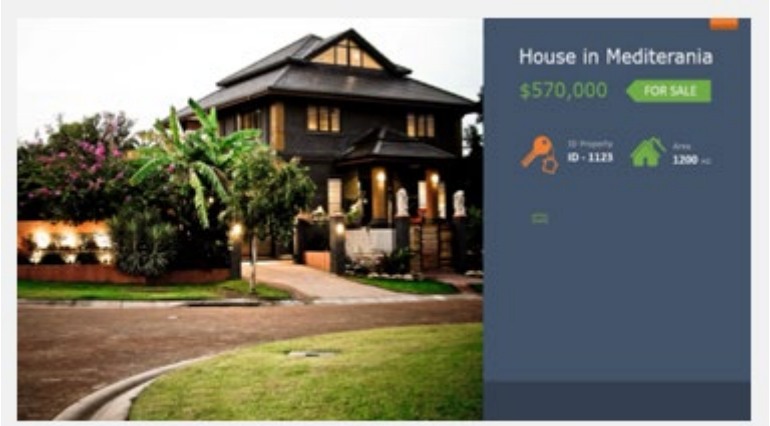
가계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가 높은 제 2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부채의 질이 악화되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고 그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간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생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부동산 선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지 토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유경(서강경영 1): 일단 제가 조사해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줄여 가계부채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일반 분양형 주택공급을 줄여 가격하락을 막는 한편, 공급 감소 부분은 뉴스테이 공급으로 해결하면서 주택임대시장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혜진(서강경영 1): 그렇지만 정부의 개입에 의한 시장 조정은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해 인위적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비율을 감소하도록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의 원리를 왜곡시킬 우려가 큽니다.

박주희(서강경영 1): 저도 어느 정도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투자목적과 실수요 목적에 따른 대출의 구분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보다 저리의 금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지윤(서강경영 1): 제도적인 차원에서 저도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렴한 소규모 평형의 공공주택사업을 늘려 서민들에게 거주의 안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선호(서강경영 1): 저는 투자목적의 수요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요자 시장과 투자목적의 시장을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투자목적의 시장에서는 리스크에 따라 프리미엄이 결정되는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과 스타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업체에게 확실한 자율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은미(서강경영 1): 저도 동의합니다. 주택공급업체에게 투자목적과 실수요자 목적을 선택하게 하고 실수요자 목적을 내세우는 업체에게는 혜택과 강력한 규제를 하는 반면, 투자목적의 경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도록 자율에 맡기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서강대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선진화를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⑦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부동산 공급 과잉 해결 방안에 대한 2차 선진화연구모임이 열렸다.

김지예(부산외대 경영 3): 안녕하십니까? 시험기간의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2 차 선진화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주택 공급 시장은 적정수준이지만, 2015 년의 주택착공물량을 고려했을 때 2017 년 말에서 2018 년도에 걸쳐 준공되는 주택의 공급 물량은 소화 능력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교와 민간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외부 기숙사 존(Zone) 형성을 제안합니다. 전국에 350 개에 달하는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데, 자체 기숙사로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부동산 공급과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자취나 하숙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요. 또한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신설하기도 하며 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되어질, 혹은 현재의 재고 주택을 기숙사로 이용할 수 있다면 주택재고와 대학생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연수(부산외대 경영 3): 하지만 기숙사의 경우는 학교와 가깝고, 저렴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민간업체의 재고 주택을 기숙사로 이용한다면 가격이 비싸고, 위치적 장점을 가지지 못한다면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재고 주택 문제도, 대학생 주거 문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쉐어 하우스를 주택 재고 활용 방안 방법으로 제안한다.

서지현(부산외대 경영 3): 신연수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를 Share House 의 형태로 3~4 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거에 드는 비용은 기숙사 비용과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Share House 와 같이 한 집에 여러 명이 살며 월세 및 관리비를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되, 대학교의 기숙사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보증금 제도를 완화 또는 제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혜빈(부산외대 경영 3): 요즘 대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비용 문제를 Share House 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면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숙사의 제도 및 생활 방식이 싫어 자취를 선택했던 사람들도 저렴한 비용과 학교의 주거시설이라는 매력에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지(부산외대 경영 3): 저는 재고 주택을 Share House 와 같이 사용하는 것에 매우 동의합니다. 최근 1 인 가구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고, 직장인 및 청년들의 타지 생활에 의해 집을 사지 않고 월세 또는 전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층에게는 1 인 가구라는 개념 소가족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 3~4 인이 사는 큰 집을 비싼 돈 주고 사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hare House 와 같은 방법으로 재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나경(부산외대 경영 3): 현재 부동산 공급 과잉은 수요와 공급을 이끄는 정부의 정책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출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대출비율이 80 프로 이상을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출비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은 대출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은행의 주택대출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실행해주고 상환 시에 주택가격 상승 부분의 일부를 은행에 주는 조건으로 1%의 이자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완화가 주택 수요를 늘리게 하고 수요가 늘어나니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 악순환을 반복하다보니 결국 공급과잉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수 경제 침체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여 냉정함을 잃고 이 부분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버블을 없애고, 적절한 규제를 실시하여 부동산 수요와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곧 마주할 부동산 과잉 공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연수(부산외대 경영 3): 그렇습니다. 제도가 현재 너무 완화되어 주택 대출이 너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고,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 결국 과잉 공급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의 의식 또한 전환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주거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변질한 것이 과잉 공급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올바른 부동산 소비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직장인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예(부산외대 경영 3): 부동산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Share House 형태로의 기숙사, 주택 공급 과잉을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인 지나친 수요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민 의식 전환을 위한 직장인 교육 프로그램 또는 대학생 공모전 실시, 주택 대출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의 방안이 오늘 제 2 차 선진화연구모임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이 의견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선진화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선진화 과제 42: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제 107 차 월례토론회)

1.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유사 이래 한반도에서 살았던 모든 세대를 통틀어 보아도 우리세대만큼 잘 먹고 잘 살던 세대가 없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건 바로 '물질적 풍요'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신적 풍요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해왔기 때문 아닐까요?

정신적 풍요를 일궈내는 동시에 배려, 나눔, 소통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10 월 20 일 목요일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배일환 이화여자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는 문화외교 자선단체 '뷰티플 마인드'를 이끌어 오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음악의 가치와 우리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음악을 통한 법고창신의 실현을 예시로 들면서 문화예술의 발전으로 '착한 선진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자 곽은아 이화여자대학교 국악과 교수는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의 실천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며 신념 있는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경제적 투자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건 이름이 아닌 '감동'입니다.

신숙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감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감동을 통해 인간과 자연,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므로 문화와 예술은 다 함께 하는 착한 선진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역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노출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서 문화올림픽을 개최할 것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 예술분야에서 가장 취약계층은 아마 학생들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하루 종일 대학 입시만을 위한 기계적인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적들은 등수를 매겨 내 옆의 친구를 경쟁상대로 만들고, 공부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교육받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입시가 가까워지면 음악시간은 자습시간이 되어버리고 그나마 저학년 때 듣는 음악수업도 이론적인 것에만 치우쳐,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쌓여만 가고 공동체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런 학생들이 자라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우리사회는 점점 공동체의식이 희박한 각박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감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론위주의 무의미한 음악수업이 아닌, 직접 여러 작품을 접하고 순수하게 작품 자체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식으로 음악수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먼저 음악수업에 석차를 매기거나 성적을 매기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음악수업은 이제 성적을 매기기 위한 교과 과목이 아닌, 교양을 기를 수 있는 교양수업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느낀 점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림을 그리거나 편지를 써도 좋고, 조형물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느낀 것을 형상화하고 이것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음악수업에 성적이나 석차를 매기지 않고 음악 수업 자체를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양수업'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자유롭게 자신의 감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신적 풍요를 이룰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② 윤다영(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부)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신적인 빈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높은 삶의 질은 물질적인 것만이 충족되어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풍요 속에 따뜻한 사회가 되었을 때만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죠. 정신적 풍요를 이루게 해주는 문화예술이야 말로 질 좋은 삶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10 월 20 일 목요일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빌딩 2 층 국제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107 차 월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배일환 이화여대 관현악 교수는 지난 10 년 동안 문화외교 자선단체인 '뷰티풀 마인드'를 이끌어온 경험을 토대로 문화예술과 다른 가치와의 만남을 통해 착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과 봉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옛 것의 가치를 이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나눔과 봉사, 화합, 법고창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어 토론자인 곽은아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는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선진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 속에서 우뚝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는 하나라는 인식을 통해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을 실천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음 토론자인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고전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가적으로는 교과 과정에 문화예술 과목을 추가하는 등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선진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문화예술 선진화의 첫 걸음은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동떨어지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의 선진화를 위해 1 인 1 예술 운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1인 1악기 운동을 통해 문화예술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1 인 1 악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필수로 하나의 악기를 배우게 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능력을 키우고 정서를 함양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진입장벽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운동을 확대해 전 국민들에게 음악, 미술 등 예술 한 가지를 취미로 가지도록 지원하는 1 인 1 예술 운동을 문화예술 선진화의 실천방안으로 삼고 싶습니다. 1 인 1 예술 운동은 국가에서 국민들이 예술을 즐기는 것을 넘어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음악, 미술, 문학 등으로 예술의 세부분류를 나누고 혼자서, 또는 함께 이를 영위해나갈 때 지원해주는 운동입니다. 지도교사를 초빙할 때, 혹은 재료를 구입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연주회를 열거나,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1 인 1 예술 운동을 통해 예술이 그저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삶 속에 들어와 있다면 문화예술의 선진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물질적으로만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아닌 정신적인 풍요까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③ 김지영(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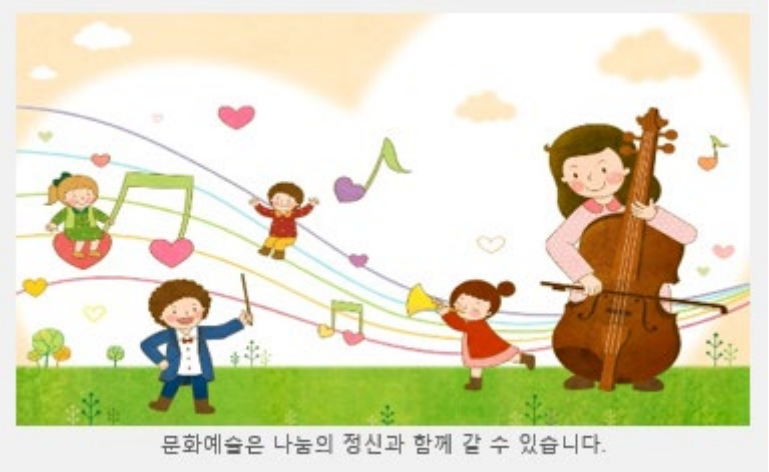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바로 삶의 질 문제입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 이라고도 불리우는 고도 성장 속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강대국이 되었지만, 물질적 풍요와 대조되어 정신적 행복의 부재라는 그림자가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나라별로 행복도를 조사해 본 결과, 대한민국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38 개국 가운데 28 위를 차지한 결과는 우리에게 행복 및 삶의 질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는 행복이고 국력입니다." 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캐치프레이즈처럼 행복의 부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문화에 집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재)한국선진화포럼은 10 월 20 일(목)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빌딩 2 층 국제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제 10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예술은 나눔의 정신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발제자 이화여대 배일환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에 한류 열풍에 주목하여, 문화와 예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파급력이 강한 문화예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할지는 현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에 봉사를 접목시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고 삶의 목적을 심어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한 음악연주 및 음악교육인 '뷰티풀 마인드'와 뮤직아카데미를 소개하면서 착한 문화적 선진화를 위해 나눔과 화합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를 소중히 하고 '우리다운 것'을 더욱 더 가치있게 여겨,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및 이를 초월한 미래까지 지속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고유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토론자 곽은아 이화여대 교수는 뷰티풀마인드에서 강조하는 3 가지 정신인 나눔 및 봉사의 정신, 장애 비장애인의 화합 정신, 그리고 법고창신의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선진화를 이끌어 가는 모임이 갖춰지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유 문화유산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성장을 이룰 시기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선진국 대열에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문화 예술이 나눔과 봉사를 만났을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발제자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문화예술이 주는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켜 삶에 긍정의 씨앗을 뿌려주고 행복을 키워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는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게 만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 모두가 문화와 예술을 자주 접해서 감수성과 미적 감각을 키워야 하며, 이를 통해 예술적 심성을 키워 사회구성원들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실천적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한 문화적 착한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교육,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하고 저렴한 공연, 예술올림픽 개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문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말을 인용했던 것처럼, 이제 문화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문화행정 관련 예산이 2000 년대 들어 우리나라 예산의 1% (1 조 이상) 급증하였는데요, 예산의 증대에 무색하게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예술 소비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부의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예술행사 관람률은 대략 60~70%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 사람 3 명 중 1 명은 1 년 동안 예술행사를 단 한 차례도 관람한 적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문화부에서 실시한 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2012 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약 60%가 휴식을 꼽았고 문화예술 관람활동(대중문화 포함)은 2.9%, 문화예술 참여활동은 고작 0.5%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서론에 제시했듯이,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동안 경제적 발전에만 몰두하여, 문화향유를 누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여가활동 조사 결과 중, 휴식을 꼽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안정상태를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하는데에만 몰두해, 문화활동을 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인 문화바우처제도를 새롭게 조명하여,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새로운 문화바우처제도를 제시합니다.


맞춤형 문화 바우처제도를 통해 문화예술의 선진화를 이루길 희망합니다.

우선, 현존하는 문화바우처제도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공연 및 전시회 입장권 및 책 등을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제도로, 2010 년 기준 1 인당 지원 한도는 연간 5 만원이며, 총 67 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문화정책인 것 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다시피 대한민국의 문화향유의 부재는 금전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문화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로부터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문화바우처제도에 국민 맞춤형 시스템을 접목시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를 향유해 가는 국민 맞춤형 문화바우처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부 조사에 따르면 60%정도의 국민들이 여가시간을 문화활동보다는 휴식을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건 바로 삶에 휴식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국민 맞춤형 바우처제도를 통해 휴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힐링 음악회', '힐링 토크 콘서트' 등을 저렴한 가격에 혹은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문화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즉 맞춤형 문화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으로는 국민 맞춤형 바우처제도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④ 김지예(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제107차 월례토론회가 지난 10월20일에 열렸다.

대한민국은 금융위기 이후 물질적 토대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OECE 조사에 따르면 행복지수는 조사대상국 38 개국 중 28 위, 삶의 만족도는 31 위를 차지하는 등 정신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질적 풍요만을 중시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은 궁극적으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정신적 풍요를 가능하게 하고, 매몰찬 경쟁주의 속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맑고 풍요로운 삶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10 월 20 일 오전 7 시 명동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배일환 이화여자대학교 관현악 교수는 “문화예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고 삶의 목적을 심어주기도 한다”며 “어떤 계층이나 계급만 누리는 문화예술이 아니라 남녀노소 동서고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로 봉사하는 방식이 인류를 선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봉사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뷰티풀마인드’와 장애아동 및 소외계층에 음악 교육을 지원하는 ‘뷰티풀마인드 뮤직아카데미’를 소개하고, 뷰티풀마인드의 해외공연에서 우리 전통 악기로 현지 민요를 연주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 낸 사례를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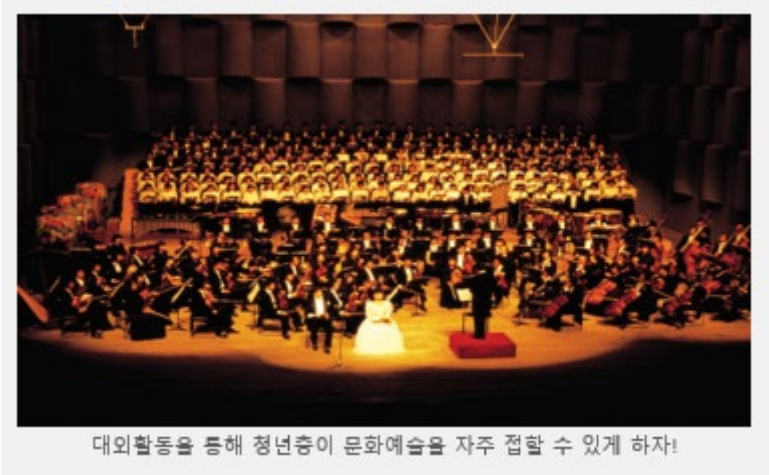
배일환 교수는 “현시대는 예술을 지나치게 실용적이고 상업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문화예술로 착한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눔과 화합,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옛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곽은아 이화여대 교수는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신념있는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투자를 해야 실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은아 교수는 “뷰티풀마인드는 나눔봉사, 장애 비장애인의 화합, 법고창신의 정신을 통해 문화예술에 있어 착한 선진화를 주도하는 단체”라며 “우리의 문화유산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성장을 이뤄 문화 강국으로서의 꽃을 피울 때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에 참석한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문화 예술이 나눔과 봉사를 만났을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배일환교수의 말에 강한 감동을 받았다”며 “시민이 자주 문화예술을 경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연극, 전시회, 음악회 등과 관련된 대외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활동을 통해 많은 수의 청년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대외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겐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대외활동을 통해 청년층이 문화예술을 자주 접할 수 있게 하자!

문화예술이 우리 삶에 가까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그 자체를 일반인들이 '멀게 느끼는 것'이 아닌 전시회, 음악회 등을 영화 보러 가는 것과 같은 문화로 장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했던 대외활동은 청년층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화예술 관련 대외활동을 활성화 시키되 번역활동과 묶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접했던 활동 중 음악회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안내 및 행사 도우미 역할을 하며 번역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번역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쌓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음악회를 알게 된 것도 매우 좋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번역봉사 및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그들이 번역과 동시에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대외활동을 추진한다면 많은 청년층이 문화예술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물질적 풍요를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현재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더 많이 접하려는 노력으로 정신적 풍요를 찾는 것, 그것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착한' 선진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⑤ 김현경(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문화예술과 '착한' 선진화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고도의 성장 속 대한민국은 세계 10 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경제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삶의 질을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OECD 는 금년에 한국의 행복지수를 조사대상국 38 개국 중 28 위, 삶의 만족도를 31 위라고 발표했고, 정신적 삶이 피폐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삶의 질 향상은 궁극적으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를 조화시키는 것으로, 정신적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예술은 사회갈등 해소와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10 월 20 일(목)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빌딩 2 층 국제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제 10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예술로 봉사하는 방식이 선진화를 이끈다.

발제자인 배일환 이화여대 관현악 교수는 문화예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고 삶의 목적을 심어주기도 하며 어떤 계층이나 계급만 누리는 문화예술이 아니라 남녀노소 동서고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로 봉사하는 방식이 인류를 선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봉사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뷰티풀마인드'와 장애아동 및 소외계층에 음악 교육을 지원하는 '뷰티풀마인드 뮤직아카데미'를 소개하고, 문화예술로 착한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눔과 화합,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옛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인 곽은아 이화여대 교수는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신념 있는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투자를 해야 실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눔 봉사, 장애·비장애인의 화합, 법고창신의 정신을 통해 문화예술에 있어 착한 선진화를 주도하는 뷰티풀마인드처럼 한국선진화에 일조를 하는 많은 모임이 생기고 그로인한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착한 선진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룹도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인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문화 예술이 나눔과 봉사를 만났을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배일환교수의 말에 강한 감동을 받았고, 시민이 자주 문화예술을 경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착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등이 필요하며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다양하고 저렴한 공연, 공공장소에서의 무료공연, 예술올림픽 개최 등을 실천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의 날을 활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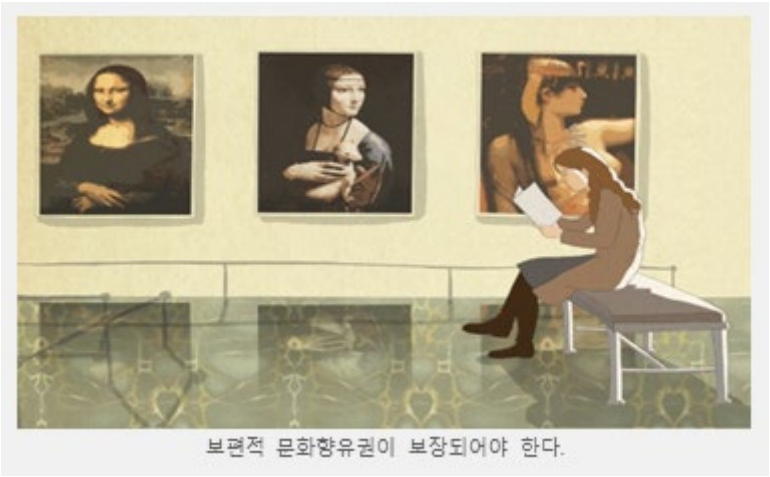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다양한 행사 및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 년에 시행된 유라이프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7%는 들어본 적 있다고 했고, 나머지 23%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문화의 날'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지역문화 시설 운영의 부족과 문화향유 기회에서의 한계라고 파악됩니다. 티켓 구매 시 구매 가능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하기 어렵거나, 개장 시간을 고작 1 시간만 연장하는 등 기관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다수 기관의 혜택이 오후 5 시 정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비교적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문화생활을 마음대로 향유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 지역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원하는 기업체에 직장배달 콘서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문화예술 활동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의 근무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장 외에도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도 '배달 콘서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문화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접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국민들의 인지도는 상승하고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박물관, 예술의전당, 미술관 등 지역중심 문화시설에 문화의 날 기획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보편적 문화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활동에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은 이를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무료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공공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운영도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홍대거리에서 청소년들의 버스킹 공연과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공연 문화가 번성할 수 있는 거리를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바쁜 일상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여유'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날'이 있는 주에는 정시 퇴근을 시행하는 등 국가적, 기업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⑥ 김효정(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제107 차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OECD 는 금년에 한국의 행복지수를 조사대상국 38 개국 중 28 위, 삶의 만족도를 31 위, 공동체의식을 37 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물질적 토대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정신적 삶은 피폐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삶의 질을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삶의 질은 물질적 풍요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누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가 모두가 바라는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의 질" 향상은 궁극적으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정신적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예술은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핵심입니다. 음악으로 치유 받고 감동을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매몰찬 경쟁주의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맑고 풍요로운 삶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선진화포럼은 10 월 20 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10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배일환 이화여자대학교 관현악 교수는 "문화예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고 삶의 목적을 심어주기도 한다"며 "어떤 계층이나 계급만 누리는 문화예술이 아니라 남녀노소 동서고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로 봉사하는 방식이 인류를 선진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봉사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뷰티풀마인드'와 장애아동 및 소외계층에 음악 교육을 지원하는 '뷰티풀마인드 뮤직아카데미'를 소개하고, 뷰티풀마인드의 해외공연에서 우리 전통 악기로 현지 민요를 연주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 낸 사례를 전했습니다.

배 교수는 "현시대는 예술을 지나치게 실용적이고 상업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문화예술로 착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눔과 화합,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옛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곽은아 이화여대 교수는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신념있는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투자를 해야 실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음악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뷰티풀 마인드!

곽 교수는 “뷰티풀마인드는 나눔봉사, 장애·비장애인의 화합, 법고창신의 정신을 통해 문화예술에 있어 착한 선진화를 주도하는 단체”라며 “우리의 문화유산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성장을 이뤄 문화 강국으로서의 꽃을 피울때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에 참석한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문화 예술이 나눔과 봉사를 만났을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배일환교수의 말에 강한 감동을 받았다”며 “시민이 자주 문화예술을 경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착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등이 필요하며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다양하고 저렴한 공연, 공공장소에서의 무료공연, 예술올림픽 개최 등을 실천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곽은아 교수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이나 일반인이 문화예술을 통한 착한 선진화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느냐"라는 질의자에 질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음악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거리를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저녁에는 신촌, 홍대 등지에서 기타와 마이크를 들고 나와 거리에서 노래를 하는 많은 청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래는 어디있을까요? 토요일 점심에 TV 에서 하는 국악 프로그램 외에는 우리가 손쉽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국악을 따분한 음악, 그냥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부르던 음악 정도로만 치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악은 우리 민족의 얼과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어떤 종류의 음악보다도 더 와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악의 진짜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국악 시간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에서 국악 교사들을 선발해 각 학교에 파견하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국악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게 해야 합니다.

뷰티풀 마인드가 우리의 음악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음악을 알고, 배워서 우리 음악의 세계화를 이룩하는 데에 일조해야 합니다. 우리 음악에 대한 깊고 풍부한 이해가 결국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 아닐까요?

⑦ 유선호(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우리나라의 전통악기로 연주된 음악이 우리 조상의 가치관을 잘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10 월 20 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10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 이셨던 이화여대 관현악 배일환 교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고 삶의 목적을 심어주는 좋은 힘을 가진 문화예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착한’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봉사를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는데 ‘뷰티풀 마인드’라는 장애인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를 서서 장애아동 및 소외계층에 음악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습니다.

토론자 곽은아 이화여대 교수는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특히 뷰티풀 마인드가 문화예술 측면에서의 ‘착한 선진화’의 선두주자로써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 시켜서 대한민국을 문화적 강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눔과 봉사가 중요합니다.

신숙원 서강대 교수는 특히 남녀노소 시민 모두가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초, 중, 고교에서 동아리나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흔히 흘러나오는 노래들을 들어보면,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통해 상업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들이 많아 문화예술의 참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우리의 옛 것의 가치 중 하나였던 문화예술을 현재와 연결하여 재창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음악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한과 정서를 반영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야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악기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곡들은 우리 조상의 정신적 가치관이 들어 있어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공식 문화예술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가담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것을 장려하며 문화예술을 어떻게 선진화 코드와 연관지어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의논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선 문화예술기관에서 일반인을 위한 지불가능한 범위 내의 공연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를 예술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예술올림픽과 같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다양한 천재들을 발굴해 내는 프로젝트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에서의 봉사와 나눔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 모두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⑧ 이권식(한양대학교 경제학과)



한국드라마를 필두로 K-pop, 한국어, 한국산 화장품과 한국 화장법 등 한류에 대한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명동 거리에는 어느덧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즐비하며, 학교 캠퍼스 내에선 한국의 문화예술에 매력을 느껴 한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진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문화와 예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신비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도시 경쟁력의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활용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과제이므로,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10 월 20 일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107 차 월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배일환 이화여자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는 문화외교 자선단체 '뷰티풀마인드'를 통해서 문화예술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착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선 문화예술로 펼칠 수 있는 나눔과 화합,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옛 것을 통해 희망과 자부심을 갖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곽은아 이화여자대학교 국악과 교수는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선진화의 실천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신념 있는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노력과 경제적 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우리의 문화유산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 예술을 통해 '착한 선진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룹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다음 토론자인 신숙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냉철한 논리나 지적인 가르침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문화예술에 표현된 순수한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기에, 그 어떤 이론보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신숙원 교수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노출 및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여야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강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무한상상실(Maker Space)'을 만들며, 우리나라에서 예술 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매개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지만, 우리 주위에서 이러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으며, 그 기회마저도 비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위에서 조금 더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길거리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우선, 길거리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 마련이 어렵다면 역 주변을 비롯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에서 사진전을 비롯하여 연극, 오케스트라 공연, 판소리 등을 선보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재능 기부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만끽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금전적인 도움을 통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길거리에서 문화예술을 공연하고,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 2, 제 3 의 길거리 재능 기부자가 나올 것이며,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 강국으로 도약, 길거리 예술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강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일궈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문화예술을 체험하며, 이러한 체험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 때에만,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발점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길거리에서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국가의 지원 외에도,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예술로 시작하는 문화 강국의 꿈, 우리 모두 같이 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⑨ 이효은(건양대학교 글로벌마케팅학과)



정신적 풍요,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인 외형의 화려한 발전과 풍요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내면에는 풍요가 깃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객관적인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OECD 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인구 10 만명당 33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 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이 1995 년 이후 자살률이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비해 한국은 153.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동안 대한민국은 물질적 궁핍 탈출에만 몰두한 나머지 스스로의 지친 마음을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나눔, 배려와 같은 정신적 풍요가 물질적 풍요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빈곤을 채우고 삶의 질을 개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의 문화예술의 활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10 월 20 일(목) 명동 은행회관에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선진화 :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107 차 월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통해 '착한'선진화를 이뤄나가야 합니다.

발제를 맡은 배일환 이화여자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는 문화외교 자선단체 '뷰티풀 마인드'를 이끌어 오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사회에서의 음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음악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법고창신의 실현을 예시로 들면서 문화예술의 발전으로 '착한 선진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곽은아 이화여자대학교 국악과 교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신념 있는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이는 문화예술과 함께할 착한 선진화를 실천할 수 있고, 지속적인 노력과 경제적 투자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신 신숙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감동'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감동을 통해 인간과 자연,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므로 문화와 예술은 다 함께 하는 착한 선진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 곳곳에서 문화 예술 감상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교과 과정에 문화 예술에 대한 기회를 갖도록 주선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문화적, 예술적 심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저는 신숙원 교수의 주장처럼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에 맞추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편하게 문화 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에도 농촌.어촌 등 평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기 힘든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이나 평소 지방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국립예술단의 대표공연을 전국의 문예회관에서 볼 수 있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지원 사업' 등 찾아가는 문화 공연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평소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21 세기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도심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로 인해 충분한 문화생활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쉽고 편하게 문화 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소외지역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 등으로 까지 확대시켜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높아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정신적 풍요로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⑩ 장정욱(경기대학교 경영학과)



메디치 가의 후원은 르네상스의 부흥을 이끌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는 금융업으로 얻은 막대한 부를 문화, 예술에 후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와 같은 당대의 예술가들이 배출되어 르네상스 시대라는 예술 부흥을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질적 풍요가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문화와 예술'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화, 예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라는 주제로 107 회 월례토론회를 개최해 이러한 높은 관심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논의하였습니다.



기업의 메세나 활동은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한다

발제자인 이화여대 배일환 교수는 직접 이끌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 연주하는 '뷰티풀마인드'란 문화예술 자선단체를 예시로 들며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이 예술을 향유하며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토론자인 곽은아 이화여대 교수와 신숙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뷰티풀마인드의 사례에 깊이 공감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의 확장과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메세나(mecenat)'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메세나는 기업의 사회공헌 중 한 형태로 메디치 가처럼 기업들이 문화, 예술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불우이웃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 소비를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이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문화 공헌은 더 많은 사람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선진화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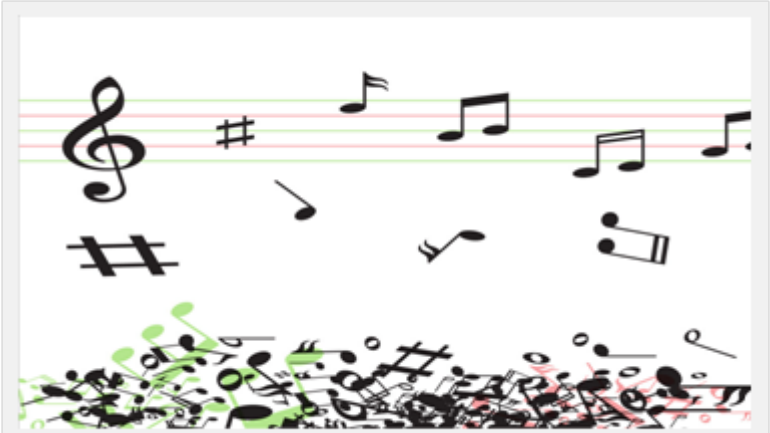

체계적인 메세나 활동은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장려하고 이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최근 시행된 김영란법이 문화 공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메세나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사회공헌에 의한 긍정적 이미지 생성으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메세나 활동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임을 인식시키고 기업 스스로도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기업과 사회 모두가 긍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메세나 활동, 문화예술의 선진화를 실천하도록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⑪ 전도훈(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음악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자유 시장 경제를 굳건히 지켜와 오늘날 이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매몰찬 경쟁주의에 빠져 우리는 삶의 여유를 잃고, 너무나 바쁜 나머지 앞만 보고 달려오게 되어 배려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소통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의 원활한 소통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20 일 오전 7 시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 제 107 차 월례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예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배일환 교수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고 어떤 계층이나 계급만 누리는 문화예술이 아니라 남녀노소 동서고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로 봉사하는 방식이 인류를 선진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 봉사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뷰티풀마인드'와 장애아동 및 소외계층에 음악 교육을 지원하는 '뷰티풀마인드 뮤직아카데미'를 소개하고, 뷰티풀마인드의 해외공연에서 우리 전통 악기로 현지 민요를 연주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 낸 사례를 전했습니다.

배 교수는 현시대는 예술을 지나치게 실용적이고 상업적으로 다루고 있고, 문화예술로 착한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눔과 화합,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옛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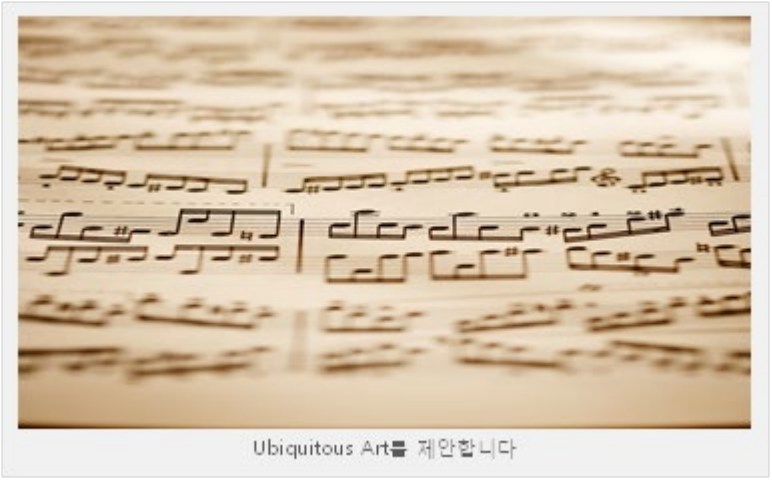
음악으로 소통하는 대한민국

곽은아 교수는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신념있는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하며 우리의 문화유산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성장을 이뤄 문화 강국으로서의 꽃을 피울때가 됐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에 참석한 신숙원 명예교수는 문화 예술이 나눔과 봉사를 만났을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배일환교수의 말에 강한 감동을 받았고, 시민이 자주 문화예술을 경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통해 착한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등이 필요하며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다양하고 저렴한 공연, 공공장소에서의 무료공연, 예술올림픽 개최 등을 실천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바른 소통은, 어떤 장애물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와도 대화가 가능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송받던 나라였기 때문에,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예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Ubiquitous Art를 제안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주하기 어려운 분들과의 소통이 가장 원활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보니, 바로 '음악'과 '예술'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때였습니다. 문화 예술은 장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루드비히 반 베토벤에 관한 일화를 이야기하며, 가장 인상깊었던 곡명을 서로 교환하며 소통을 해봅시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는 정기적인 중등교육과정으로 음악 교육을 받고, 대학 교양 음악 교육을 약간 이수한 것, 중•고교 미술시간에 작품 몇개 본 것이 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통하는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도처에 예술이 살아숨쉬어야 합니다.

유비쿼터스 아트는 말 그대로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음악과 예술을 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풍토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힌다면, 사람들간의 불통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지리라 예견됩니다. 음악으로 열린 마음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음악 교육만으론 음악과 미술에 관해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고, 길거리에서, 마트에서 클래식과 우리 민족 고유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지역 도서관과 연계하여 해설이 있는 음악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어서 말그대로 도처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흥이 있는 민족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쳇바퀴같은 일상 생활을 반복하며, 삶의 질 순위 하위권으로 전락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와 즐거운 생활을 향유하는 국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⑫ 정영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문화예술과 함께 "착한"선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소득은 3 만 달러에 육박하여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OECD 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가 38 개국중 행복도 지수는 28 위에 불과했고 공동체의식 순위는 37 위로 최하위수준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매몰찬 경쟁주의로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고 함께 더불어 가는 따뜻함은 부족한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는 전 계층이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착한 선진화”운동을 핵심 아젠다로 선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 일환으로 지난 10 월 20 일에는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제 10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배일환 교수께서는 지난 10 년 동안 문화외교 자선단체인 뷰티풀마인드를 이끄시면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를 몸소 실천해오고 계셨습니다. 뷰티풀마인드는 장애, 비장애

연주자들이 하나되어 60 여개국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희망과 기쁨을 전해주는 나눔과 봉사를 해왔습니다.

배교수께서는 뷰티풀마인드 경험을 통해 문화예술가치를 기반으로 창조적 나눔활동에 나선다면 사랑을 선물 받는 이 뿐만 아니라 선물하는 사람에게도 더 큰 따뜻함과 꿈이 된다는 점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활동에는 법고창신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창조적 나눔활동에 더해 문화예술의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곽은아 교수께서도 뷰티풀마인드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문화예술이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또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신념있는 지속적인 노력과 경제적 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신숙원 교수께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의 비극의 효과를 인용하시면서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문학과 예술을 통한 비극의 간접경험을 통해 역지사지와 측은지심을 느끼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켜주는 문화적, 예술적 심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최대한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규교육과정에서 미술과 음악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음악과 미술과목의 수업시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해 음악과 미술활동을 즐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방과후에는 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밀리고, 학교에서의 정규수업 시간은 국영수과목에 밀려, 음악과 미술을 접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중학교,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음악과 미술수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음악과 미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음악과 미술교육은 이론중심이 아니라 체험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동안은 제한된 수업시수 동안에 주어진 교육과정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음악과 미술과목의 수업시수 확대와 더불어 이론중심의 교육과정을 개편, 체험중심의 수업을 지향하여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심신을 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학교에서의 음악과 미술수업이 지역사회봉사활동과 연계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외된 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마을회관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소박한 음악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따뜻한 심성을 기르고 착한 선진화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⑬ 최상연(한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한강의 기적' 이라 불리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많은 이들은 물질적 풍요에 비해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닌 정신적 풍요를 지향해야 하는 이 때,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10 월 20 일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이라는 주제로 제 10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관현악과 배일환 교수는 지나치게 실용적이고 상업적 예술만을 고집하는 현대의 문화적 혼란을 꼬집으면서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이으며 서로 화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외교 자선단체 뷰티플 마인드를 소개하면서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국악과 곽은아 교수는 발제자가 이야기 한 문화예술의 영향력에 깊이 공감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며 문화적 선진화에 다가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화 강국으로서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강대 신숙원 명예교수는 문화의 근본적 목적은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 하며 문화예술이 아름다움을 통해 기쁨과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자주 접하여 아름다움에 감동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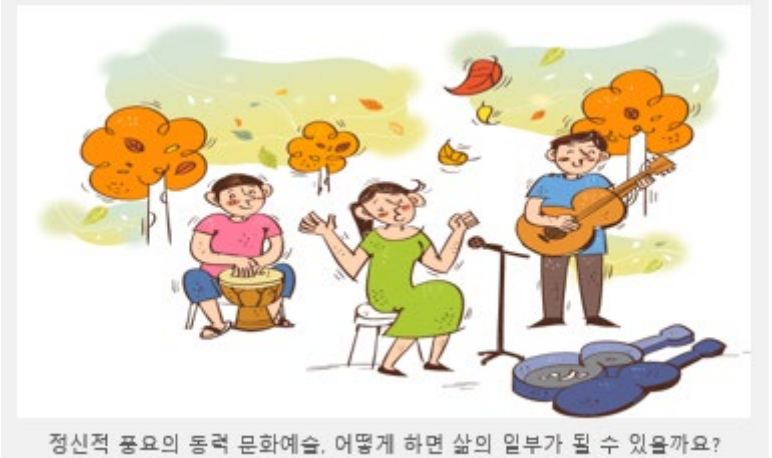


문화예술은 정신적 풍요를 가져오며 성숙한 선진사회를 건설합니다.

매몰찬 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문화예술은 그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문화활동보다는 입시위주의 예술, 상업 예술이 판을 치고 있기에 진정한 문화예술이 무엇인지, 문화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무엇인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풍요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물질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들이 성숙한 정신문화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은 '부유한 사람들의 것' 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이 엘리트 예술이 아닌 생활 예술로 다가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풍요의 동력 문화예술, 어떻게 하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릴 적부터 스포츠, 악기 하나쯤 다룰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문화예술은 그들의 삶의 일부로 자리잡으며, 서툰 솜씨로 음악회나 전시회를 열면서 남들과 공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몰찬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도 입시교육에만 목매는 시스템이 아닌 일상 생활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문화예술을 통해 건전하게 해소하고,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 동아리나 길거리 공연을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전통과 혼이 담겨있는 전통문화예술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접목시켜 고전 문화예술을 이어 나가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속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의 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고 지속해나가며 문화관광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⑭ 하성수(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위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 세계 경제규모 11 위의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성장은 '경제적인 성장' 뿐이었습니다.

2016 UN 세계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58 위이며, 대한민국의 '사회의 질',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 순위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입니다. 즉, 현재 우리 사회는 '매몰찬 경쟁주의',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로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사회는 경제적, 물질적 성장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정신적, 문화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때야 비로소 진정한 선진사회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신적, 문화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재) 한국선진화 포럼은 10 월 20 일(목) 명동 은행회관 빌딩 2 층 국제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 실천 방안'을 주제로 10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배일환 이화여자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창조적 나눔 활동에 주력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기쁨을 되찾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화예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고 삶의 새로운 목적을 심어주며, 어떤 계층이나 계급만이 누릴 수 있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동서고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나누고 문화예술로 봉사하는 방식들이 인류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선진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곽은아 이화여자대학교 국악과 교수는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의 실천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신념 있는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노력과 경제적 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세계 각국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직접 실천한 음악적 봉사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이 봉사와 만났을 때 집과 부모 그리고 삶의 꿈을 잃은 지구촌 어린이와 불쌍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전달해주는 힘을 만들어 낸다고 말했습니다.

신숙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문화와 예술에 표현된 순수한 아름다움을 체험할 때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마음이 순화되고 평화로워지며, 이러한 감동을 통해 인간과 자연,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불어넣어 주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화적, 예술적 심성을 키워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며 품격 높은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을 자주 접해서 친근해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감수성과 미적감각을 키워 문화, 예술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 감상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며, 우리를 웃음 짓게 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37 명이 자살하는,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이는 지난 60 년간의 눈부신 경제성장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며 '황금만능주의 사회'를 만들어 냈고, '매몰찬 경쟁주의 사회'를 만들어 각박하고 스트레스 넘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정신적인 삶의 중요성을 잊고 있습니다.

성숙한 선진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정신적인 풍요도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재미있는 영화를 봤을 때, 멋있는 공연을 관람했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표정과 마음이 웃음 짓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문화예술을 감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았듯이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즉, 우리의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우리의 삶 주변에 활성화시켜 정신적 풍요를 이룹시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문화예술 감상'을 멀고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것 같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의 벽'이 있고, 두 번째로, 지방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우리의 삶 주변에 많이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화예술 감상'이 누구나 원한다면 일상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기존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학교와 도서관, 공원같이 모두가 부담 없는 공간을 '문화예술 감상의 장(場)'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센터에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생활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술전, 뮤지컬, 음악회 등을 '전국투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전 국토에서 모든 국민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정신적 풍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선진사회로 가는 길,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신적 풍요'입니다.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우리의 삶 주변에 가까이하고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 행복하고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돋움합시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정영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9 월 제 107 차 월례토론회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국내전문가들과 열띤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경제성장률 달성에 있어서 부동산 건설경기의 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해 건설업중심으로 경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급격해져서 정부는 8.29 대책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부동산문제는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거시경제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국민들의 피부에는 크게 와 닿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시경제 차원에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지적인 성격이 큰 이슈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지자체에 부동산 정책관련 컨설팅을 해 줄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지자체 스스로가 부동산관련 정책을 내놓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관련 인력들을 각 지차체마다 갖춘다는 것은 비용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제안에 대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지역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현(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부동산문제가 국지적이고 지역적 성격이 강한 것은 맞지만, 지역마다 컨설팅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각 지자체의 문제들도 신도시 중심의 신규분양 지역, 강남지역, 서울 비강남지역, 지방중소도시, 수도권 이렇게 분류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도 국지적 이슈들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역의 부동산문제는 지역사회 구성원간 이해갈등의 측면이 크기도 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지역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지역 원룸업자들이 공실을 우려해서 학교 기숙사 건립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는 정책적인 접근보다도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갖춰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상민(고려대 식품자원경제 4): 저는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기관 설립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주도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의 힘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정부개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적정선을 정하고 정부와 민간과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진언(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저도 강상민 학우의 의견처럼 시장원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의 역량을 키운다면, 지역적 이슈들도 상당 부분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증감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부동산 문제들 상당수가 수요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합니다. 탄력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원활한 택지공급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택지공급을 담당하는 토지주택공사가 민간 기업수준만큼 민감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효율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탄력적인 주택공급에 제약을 가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규제들을 점검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호재(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저는 지자체 컨설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문진언 학우의 의견처럼 많은 지역적 문제들이 수요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기는 하지만, 수요공급만 매치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다수 있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한 상호보완적으로 지자체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컨설팅이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구성원 그리고 중앙 컨설팅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역부동산문제도 시장역량을 키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영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지자체 컨설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자체는 이해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원리에 기반해서 공급문제를 중심으로 시장의 역량을 키운다면 지역의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고 지역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완적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경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메세나 활동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장정욱(경기대 경영) :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가 금융업으로 벌어들인 부를 통해 예술가들을 후원하여 찬란한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산업화를 통해 궁핍에서 벗어나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국 문화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란 주제로 10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중이 문화예술을 일상 생활에서 소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메세나 활동은 마케팅 수업에서도 다룰 정도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메세나 활동은 기업의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자 대중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의 방안으로 메세나 활동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박지훈(경기대 경제) : 좋은 방안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중시되는 것을 고려할 때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메세나 후원이 기업의 이미지 상승과 같은 무형적 가치를 많이 가져다 준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효과가 분명해질 때 더 많은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SNS를 이용해 홍보하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안영준(경기대 경영) : 메세나 활동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해야 더 많은 후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SNS 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더욱 높인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욱(경기대 경영)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SNS 를 활용한 홍보는 젊은 층을 공략하는 측면이 큽니다. SNS 를 활발히 이용하는 젊은 계층인 대학생이 더욱 공감할 만한 방안이 있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어떠한 방안을 시행해볼 수 있을까요?

안상진(경기대 경영) : 많은 학교에는 연극이나 음악, 미술 등 예술 분야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들은 활동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런 예술 동아리를 지원해 같은 학교 학우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훌륭한 메세나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대학생들에게 더 깊이 다가가는 이러한 방안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민에스라(경기대 사회복지) : 앞의 의견에 크게 공감합니다. 특히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졸업작품 등을 제작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고, 이를 전시하는데 드는 대관비용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작품을 졸업작품 전시회에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이 대관 비용을 지원하거나 자사의 건물 로비 등을 대관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를 도와 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미래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돕는다는 측면까지 있어 후원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장정욱(경기대 경영) :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자 대부분이 마케팅 관련 수업이나 공모전 등을 다수 경험해 본 만큼, 이번 토론에서 나온 방안들은 실제로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현직자들께서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메세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선진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경기대학교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③ 한양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문화예술의 생활화! 거리예술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권식(한양대 경제 4) :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3 차 한양대학교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 월 한국선진화포럼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10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선, 위 주제로 월례토론회가 개최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2016 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 가입한 지 20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은 1996 년 10 월 11 일 OECD 의 29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된 이후, 1997 년에 닥친 외환위기와 2007 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련 속에서도 국내총생산(GDP) 11 위, 세계 수출 규모 6 위 등 경제 외형을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OECD 가 지난 5 월 발표한 '2016 년 더 나은 삶 지수(BLI·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OECD 34 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대상 38 개국 중 28 위를 차지하였으며, 삶의 만족도 31 위, 공동체의식 37 위 등 삶의 질을 평가하는 전반적인 항목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소홀히 여겨왔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까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만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순 없습니다. 즉, 삶의 질 향상은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를 조화시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적 풍요로움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술'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아쉽게도 실내 극장 및 전시장에서 펼쳐지는 예술은 근본적으로 대중과 교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국내 예술 시장은 대부분의 창작 공연예술이 침체되어 있으며, 해외 영화·공연이 아니라면 관객들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예술과 관객 사이의 '눈높이가 어긋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거리예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예술(Busking)은 현실 속에 예술가와 그의 작품, 그리고 관객이 가장 가깝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예술은 종합예술의 장(場)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공간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펼쳐지는 거리예술은 공간과 관객만 있으면 노래와 퍼포먼스, 서커스, 그림, 사진,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종합예술의 장(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거리예술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며, 그렇기에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신찬혁(한양대 경영 4): 우선, 국내 문화예술활동의 현황를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행사 관람률은 2003 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65.8%를 기록한 영화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예술행사 관람률은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술행사를 직접 참여한 경험은 4.7%에 그쳤으며, 그 분야도 미술전시회 참여율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연극, 뮤지컬, 행사 순으로 직접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활동이 저조한 이유를 응답비율로 나열하자면 높은 비용, 시간 부족, 관련정보 부족, 관심있는 프로그램의 부재 등 애로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높은 비용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데 큰 제약사항으로 작용하는 만큼, 거리예술이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 거리예술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국내 거리예술 역사가 짧다는 점을 들 수도 있지만, 일반시민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거리예술가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동수(한양대 기계 4): 그렇다면 국내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주요 도시의 거리예술 성공사례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선, 일본 도쿄의 헤븐아티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쿄의 헤븐아티스트(Heaven Artists)는 2002 년 도쿄도청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연가와 관객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여 공연예술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도청은 공개오디션(public auditions) 진행, 라이선스 발급 등 모든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오디션 자격은 도쿄 거주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공연 장르에도 제한은 없지만 마임과 저글링 팀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공연 중 엠프사용이나 CD, DVD 등의 상행위는 원래 불법이지만 대중에게 큰 피해만 없으면 대체로 묵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뉴욕의 뮤직언더뉴욕을 살펴보겠습니다. '뮤직언더뉴욕'은 1987 년 시작된 뉴욕의 대표적 지하철 거리예술 프로그램으로 미국 시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거리예술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매해 오디션을 통해 10~20 명이 선발되며 회원은 한 달에 두 번씩 공연할 수 있습니다.

뮤직언더뉴욕 프로그램은 거리예술가들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하철음악가 및 공연가를 위한 지침'(guide for subway musicians & other performers)을 두고 공연가의 권리와 의무를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지침에 나와 있는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권식(한양대 경제 4): 그렇다면 해외 사례처럼 거리예술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현지(한양대 프랑스언어문화 4): 국내 거리예술이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청계천아티스트, 대학로 거리공연인 연합(ADSP), 레일아트(Rail Art) 공연 등이 있지만, 공연장소의 부족, 거리예술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단조로운 콘텐츠, 거리 예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 사례만큼 거리예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장, 공원 등을 거리예술 공연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광장, 공원 등을 공연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값비싼 공연시설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리예술가들에게도 기회의 장(場)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서울문화재단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거리예술(busking)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민의 과반수(49.8%)는 거리예술 감상비를 기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공연의 수준이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29.8%), 남의 이목 때문에 기부행위가 어색해서(27.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거리예술가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금전적인 문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연의 수준이 훌륭하지 못한 이유는 거리예술가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습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2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펀드레이징과 결합한 거리예술을 시행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펀드레이징과 결합한 거리예술을 통해 거리예술가는 안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더불어 시민들은 타인의 이목에 신경쓰지 않고 자발적 감상비를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거리예술가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며, 결국 일본의 도쿄 헤븐아티스트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거리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찬혁(한양대 경영 4) : 하지만 펀드레이징과 결합한 거리예술을 시행한다고 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펀드레이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펀드레이징과 결합한 거리예술의 성공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시민들에 의한 펀드레이징보다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메세나(Mecenat) 활동을 촉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메세나 활동은 펀드레이징보다 거리예술가의 금전적인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기업은 메세나 운동에 참여하여 공유가치(CSV)의 실현과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펀드레이징, 메세나 활동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혜린(한양대 프랑스언어문화 2) : 거리예술가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펀드레이징과 메세나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예술을 감상하는 일반 시민들은 펀드레이징을

통해 자발적 감상비를 기부할 수 있으며, 신찬혁 학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업은 메세나 활동을 통해 공유가치를 실현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단순히 공연장소만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거리예술가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을 거리예술가의 연습실로 임대해준다면, 앞에서 언급되었던 낮은 수준의 공연을 개선하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각 대학별로 거리예술축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연전(연고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별 거리예술 대항전을 통해 대학생 및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지역 상권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에 다양한 독립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루프탑 필름 클럽처럼 주변 풍경이 보이는 탁 트인 공간에서 독립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 영화관은 저렴한 요금으로 고객을 유치해야 하며, 이렇게 유치된 자금은 다시 한 번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동수(한양대 기계 4) : 저는 지하철 여유 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지만, 인지도가 미비한 레일아트(Rail Art)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내부 시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문화공간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대전시 지하철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문화공간은 주로 중·고등학교 댄스 동아리과 연극 동아리, 그리고 사회인 밴드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지(한양대 프랑스언어문화 4) : 저는 조동수 학우의 의견에 일부 반대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거리예술가의 난립은 거리예술의 퇴보를 조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외 사례처럼 경쟁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거리공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예술을 교육형·참여형 예술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리예술을 단순히 관람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참여의 장(場)으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형·참여형 예술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버스킹을 하는 밴드에서 기타, 드럼 등을 배우고 그 자리에서 합동연주를 하거나, 저글링을 하는 거리예술가에게 직접 저글링을 배워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형·참여형 예술을 통해 예술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권식(한양대 경제 4): 지금까지 제시해주신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리예술가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 펀드레이징을 통한 모금, 메세나 활동을 통한 지원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거리예술가에게 공연장소 및 연습장소를 제공, 대학별 거리예술축제 시행, 교육형·참여형 거리예술의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양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④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서강대학교에서 제 3차 선진화 연구모임이 열렸습니다.

유선호(서강대 경영) :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0 년간 산업화를 통해 빠르게 경제적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는 드디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관심과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더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예술활동은 별로 각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바쁜 현대인들의 삶의 일부가 되게끔 문화예술을 어떻게 향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 월 한국선진화포럼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란 주제로 10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소한 실천방안들이 무엇인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박주희(서강대 경영) : 저는 이 문화와 예술만을 위한 것보다도 교육과 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춤추는 역사박물관'은 한국 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의 '2016 문화예술 교육사와 함께하는 예술교육이 바뀐다' 지원사업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의 리더쉽을 다루며 그 리더십의 진정한 가치를 무용예술을 통해 이끌어내는 융합예술 교육입니다. 이렇게 대상 연령대인 초등학생들에 맞는 눈높이식의 교육을 통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문화예술을 끊임없이 노출 시킬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신유경(서강대 경영) : 저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주 진행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커리큘럼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에 예술 분야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연극, 흑인 음악, 밴드, 뮤지컬 등 전문성을 가졌거나, 친목 도모 혹은 취미 등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아리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정기공연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러한 음악적 재능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내의 여러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들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양혜진(서강대 경영) : 저는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SNS 를 통해 자신만의 사이버 상의 공간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공감할 만한 작품들로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지윤(서강대 경영) :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문 예술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후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졸업작품을 제작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드는 만큼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서은미(서강대 경영): 저도 제 친한 친구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대관 비용이 너무 비싸서 대여하는 데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대한민국의 더 좋은 예술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잠재적 예술가들이 자신의 잠재된 실력을 연습하고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학교 단위로 대관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적인 테두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싼 대관료 탓에 미술 전시회를 갖기 힘듭니다

각 학교 내에서도 학교 학생들이 공부 이외의 문화 예술 활동의 목적으로 더 원활하게 강의실 이나 연습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호(서강대 경영) :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앞서 내주신 의견인 동아리를 통해서, 역사 예술 융합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 주고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면에 있어 그 효과가 상상 이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효과가 분명해질 때 더 많은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더욱 더 활성화된다면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선진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서강대학교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서 좋은 토론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⑤ 한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물질적 풍요 속 여러분은 행복하신 가요?

최상연(한동대 컴공 2): 제 3 차 선진화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 월 한국선진화포럼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이라는 주제로 10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제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낮은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적 풍요에 비해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질로 이룰 수 있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기에,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우리의 정신적 풍요를 지향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이 삶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어렸을 적부터 악기 하나씩 다룰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우리도 입시교육에만 목매지 말고 일상 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 내 문화예술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강의 필수화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지, 또한 문화 예술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황현정(한동대 제품디자인 2): 강의 필수화가 각 대학마다 문화예술 강의를 만드는게 필수인 건지 전공이나 교양과목처럼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상연(한동대 컴공 2): 제가 말한 강의 필수화는 대학생들이 필수로 들을 수 있도록 강의 필수화를 이야기 한 것인데,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정(한동대 제품디자인 2): 대학생들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강의 필수화는 반대입니다. 우선 문화예술이 일상생활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강의 필수화가 된다면 오히려 시험 등에 대한 압박감 및 지루함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문화예술분야 강의 개설을 필수로 한다면 학생들이 이 분야에 접근할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상생활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들에게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할인과 같은 혜택이 많아져야 합니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지역과 비교하여 양질의 공연이나 전시회에 접근성이 낮은데 이를 해결하기위해 각 지역의 교육청, 사회복지와 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준규(한동대 생명 2): 저도 전공수업과 같이 문화예술 수업을 필수화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문화예술이 일상생활이나 대학 내 문화로 자리잡으려면 질 좋은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야하는데, 강의 필수화로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을 위한 질 좋은 문화 컨텐츠를 위해선 무조건적인 강의 필수화 보다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다은(한동대 심리 3): 저는 대학 내 문화예술 관련 강의 필수화에 찬성합니다. 교양과목 필수화가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 관련 강의 필수화를 통해 평소 접할 수 없거나,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필수화가 될 경우 그 만큼 질 좋은 강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주선(한동대 국제 4): 세상이 각박해지기에 필수화에 찬성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자리잡으려면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접근 가능해야 하며 개인 관심에 맞게 끌리는 컨텐츠가 필요한데 개인적인 문화예술을 제공할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각 지역 정부기관과 연결해 다양한 컨텐츠를 값싸게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야합니다

한선교(한동대 생명 2): 저는 문화예술 수업 필수화가 우리 삶에 문화예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수업이 아닌 일정 돈을 지불해야 하는 양질의 특강과 함께 전시전이나 체험전을 통해 조금씩 문화예술이 대학문화로 자리잡게끔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최상연(한동대 컴공 2): 적극적으로 모두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선진화연구모임에서는 월례토론회 주제인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에서 나아가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 내 문화예술 관련 강의 개설화와 필수화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찬반토론을 요약해보자면, 찬성의 의견으로는 질 좋은 강의 개설을 전제하였을 때, 대학생들이 평소 접할 수 없거나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의를 통해 제공 되는 좋은 기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 의견으로는 시험 등에 대한 압박감 및 지루함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필수화를 통한 강제성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화 예술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지역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값싼 가격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과, 높은 질의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풍성하고 이상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매몰찬 경쟁시대 속 현대인들에게 문화예술은 그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정신적 풍요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다면 바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3 차 선진화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과 국악 교육 확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효정(이화여대 경영 1):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10 월 20 일 목요일 오전 7 시에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107 차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자와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곽은아 교수님과 배일환 교수님은 ‘뷰티풀 마인드’라는 자선단체에 소속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음악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치유하는 활동을 하십니다. 국악과 양악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음악을 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의 국악 교육 확대를 제안합니다. 어릴 때부터 국악에 대해 잘 알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지인(이화여대 경영 1): 저도 동의합니다. 유럽에서는 그들의 음악 문화를 유지하고 잘 향유해 나갑니다. 그 때문에 자신들의 음악 문화에 대한 자부심 또한 남다릅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음악 문화인 국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국악에 대해 잘 알고 흥미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단순한 음악이 아닌 국악에 대해서 배워서 우리부터 우리 음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호원(이화여대 경영 1): 현재 국악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국립 국악원에서는 연주자들을 거의 십 년만에 한 번씩 채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악기 연주는 정년 퇴직이란 개념이 없고 경력이 오래되면 오히려 장인으로 더 대우해주기 때문에 젊은 국악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잉여 인력을 교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음악 선생님이 양악과 국악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국악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국악 과목 교사들을 따로 채용하여 국악에 더 집중해서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깊이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김유빈(이화여대 경영 1): 저는 국가에서 더 많은 숫자의 교사를 임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국악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피아노 학원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가야금이나 판소리 학원은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만질 수 있는 국악기는 고작해야 단소가 전부인 것입니다.

이수연(이화여대 경영 1): 또는 중고등학교 동아리나 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국악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에 악기 구매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정(이화여대 경영 1): 우리 음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국악에 대해 잘 알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음악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이윤재(이화여대 경영 1): 우리나라 콘텐츠에 국악적 가치를 집어 넣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영화들이 해외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그 흐름에 편승해서 그런 OST 를 국악 풍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조선시대의 악단을 다룬 사극을 제작한다든지 또는 국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성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삽입되는 음악이라도 국악풍으로 만들어 해외에 수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린 대장금!

이수연(이화여대 경영 1): 저도 동의합니다. 그의 구체적인 예로 한류의 시작점에 있는 대장금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우리나라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 곳곳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복뿐만 아니라 대장금의 메인 OST 인 '오나라'는 대장금의 인기와 더불어 외국에 한국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를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궁'에 삽입되었던 '두 번째 달'의 음악들도 국악과 양악의 퓨전 격인 음악들이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층에게 국악이 마냥 지루하지 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윤재(이화여대 경영 1): 국악의 해외 진출을 통해 국악을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잉여 인력들을 해외에서의 국악 교육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악의 해외 진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이화여대 경영 1): 저는 파급력이 큰 미디어로 국악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대학생들을 활용해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요즘 활성화되어 있는 버스킹 문화 등 젊은 이들의 기호에 맞는 방식으로 길거리에서 사물놀이나 국악기 연주 등을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길거리 연주나 국악에 대한 공연 등을 대중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나 기자단을 만들어 SNS 를 활용해 젊은 층에게 국악에 대한 정보를 공급해야 합니다. 문화재청과 국립 국악원이 연계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대학생들을 모은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국악을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유빈(이화여대 경영 1): 동의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져도 홍보가 부족하면 동참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만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단순 국악과 국악 연주회를 알리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뷰티풀 마인드'와 같이 문화 예술로 봉사하는 데에 비전공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정(이화여대 경영 1): 저는 평소에 뮤지컬을 자주 보는 편인데 뮤지컬 공연에 쓰이는 오케스트라는 모두 양악기로 이루어져있어서 국악인들이 설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대중들에게 알려진 국악 뮤지컬도 얼마 없기 때문에 국악 뮤지컬을 많이 만들어서 국악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도 잉여 인력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연(이화여대 경영 1): 동의합니다. 저는 세계 명작을 국악으로 풀어내는 뮤지컬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극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국악인들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효정(이화여대 경영 1): 지금까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의 구체적인 갈래로 국악 교육의 확대라는 소주제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공교육에서의 국악 교육 확대, 국악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 콘텐츠를 통한 국악의 해외 진출, 대학생을 활용한 국악 서포터즈 등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진화 과제 43: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

(제 108 차 월례토론회)

1.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세계 경제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대내외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국입니다. 영국은 EU 를 탈퇴했고 미국에서는 대선이 치러졌으며 한 때에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던 우리나라는 몇 년째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때, 한국경제의 상황을 살펴보고 2017 년 한 해 경제를 전망해보는 동시에 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한국선진화포럼은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난 11 월 24 일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017 년의 경제전망을 나타내는 각각의 지표들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내외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가계소비, 기업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소화 능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 했습니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틀 속에서의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계 흐름 속 한국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가계부채, 연금재정문제, 한계기업 정리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기회를 찾도록 기업 환경의 개선, 세금부담 규제부담 고용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제도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 근로자,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조속히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회복해야 경제위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고,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종 경제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고,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각종 경제개혁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이성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세력들은 국민들의 경제이해도가 낮다는 것을 악용하여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지식을 갖고 지금 나라에 꼭 필요한 합리적인 생존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들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들이 경제 이해력을 길러야 합니다.

경제학적 지식을 갖춘 국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경제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경제학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거리는 좁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짤막한 길이의 쉽고 재밌는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아침 출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경제지식 관련 토막글을 작성하여 앱을 설치한 사람들에게 푸시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유명 웹툰 작가들과 협업하여 경제학 용어들이나 주요 개념들을 소개하는 웹툰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학을 단순히 딱딱한 학문이라고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서는 경제개혁이 꼭 필요하고, 이 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을 갖춘 국민들의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공작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제 이해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각종 개혁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밑바탕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② 윤다영(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부)



최근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부채의 증가라는 위기의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정치적으로는 국가 거버넌스가 마비되어 위기를 헤쳐 나갈 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11 월 24 일 목요일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이라는 주제로 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세계경제의 성장률 실적치은 IMF 의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며 2017 년의 전망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6 년보다 낮은 2.5%로 전망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수출 부진으로 2%대에 머물 전망입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트럼프 당선에 대해 “단기적으로 조세감면,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성장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세계경제의 침체 우려가 있다”며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내수시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의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한국은 그 속에서 역할을 잘 정립하고 단기적인 정책 대신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대내외적인 문제를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토론자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저성장을 넘어 제로성장, 마이너스의 성장의 위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구 절벽으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흐름의 변화에 따라 세계무역에 대해서도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토론자인 김종석 국회의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시장 충격에 대한 기업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고용제도의 유연화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노동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은 기업과 가계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이 건전해야 가계의 소비가 늘 수 있고 기업의 생산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내수시장의 축소와 수출 부진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있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만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보험제도 유무 등 처우가 판이하기 때문에 모두가 정규직을 원하는 것이죠.

대우 받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업들이 원하는 경력직 채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신입 사원 대신 비정규직 경력 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단축과 탄력성 강화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고용의 증가로 근무시간은 단축되고 오전에 일하는 근로자, 오후에 일하는 근로자로 나뉘는 등 근로 탄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주 4 일 근무가 실현될 수도 있겠네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첫 걸음입니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구조로 인해 기업들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한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만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③ 김지영(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2017년의 한국경제는 침몰하게 될까요? 또는 회생하게 될까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인 경제적 저성장의 풍파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당선 및 국내 정치적 혼란등으로 국내를 둘러싼 혼란은 현 한국의 경제저성장 늪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수출 부진, 내수의 흔들림, 투자와 소비의 추락 및 치솟는 가계부채 수준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불안감은 2017 년에도 계속 되는 것 일까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국선진화포럼은 11 월 24 일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017 년 IMF 세계경제 성장률 실적치의 하락을 예측하면서 이에 따라 한국 경제성장이 저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신정부 출범이 조세감면과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라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정치 및 경제의 불확실성은 가계소비 및 부채상황과 주택시장의 리스크 등을 초래하며 덧붙여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위험요소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토론자 김종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기업의 경쟁력에 주목하면서 기업들이 노동시장 개혁 및 구조조정 등 크나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투자와 혁신의 기회를 찾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용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급변하는 세계의 경기 변화에 발맞춰 한국 경제 또한 이에 따라 유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경제에 대해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으로 토론자 안세영 교수는 정부재정의 역할에 주목하며 이를 제대로 다루어야 함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국내 민간 소비를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자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역동적인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의 경제 주도는 시대착오적인 점에 주목하며 2017 년에는 보다 안정적인 경제 흐름을 정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제시 된 것처럼 한국경제는 대외적인 요인인 브렉시트, 미국 신정부의 출범 및 대내적인 요인인 수출부진과 가계부채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여파로 인해 내년에는 크고작은 변화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시장을 살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덧붙여 토론자 권남훈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더 이상 정부 주도의 경제는 시대의 흐름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단지 시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에만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안정화를 되찾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타켓을 고령화 사회에 맞게 노인 인구에 맞추어야 합니다.

최근 국내에는 기하급수적인 고령화 인구의 증가 및 인구 절벽에 따른 내수 시장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시기 속에서, 한국은 국내의 문제점 및 상황을 진단해 보면서 그 무엇보다 자국의 경제적 자립도를 단단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실버 세대를 활용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점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기나 의약품과 같은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실버 산업을 타켓으로 하며 무엇보다 국외 상품 및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실버 산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치솟은 물가를 낮춰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 정책 및 제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퍼즐 중 하나는,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 입니다.

더 이상의 저성장은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집행되어 이러한 위기를 타파해가야 합니다. 다양한 해결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2017 년 한국경제가 회생하고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④ 김지예(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11월 24일 한국선진화포럼의 제 108차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대내외적 불안한 정치, 경제 상황 등으로 투자와 소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위기를 피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 선진화 포럼은 지난 11 월 24 일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017 년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실적치가 대체로 전망치를 하회함에 따라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당선에 따라 미국경제는 단기적으로 조세감면,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성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세계 경제와 동반 침체 우려가 있어 한국경제는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내외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가계소비, 기업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채 상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소화 능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안한 경제. 이유가 무엇일까?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내의 정치 경제 불안의 원인을 “국가 주도적 관치경제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귀적, 퇴행적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의 목표전환, 경제적 자유와 복지의 전화, 청년에 대한 새로운 희망제시 등의 변화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단기적 처방을 위해 거시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가계부채, 연금재정문제, 한계기업정리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석 국회의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기회를 찾도록 기업 환경의 개선, 세금부담, 규제부담의 고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석 의원은 “특히 고용제도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이 경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 근로자, 국민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조속히 국정의 안정과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회복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영국의 증기기관과 같이 미래를 선점할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선진국이라 불리는 많은 국가가 17 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고, 그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어 현재의 위상에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은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점령한 것이 400 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는 단순한 숫자로 표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현저히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4 차산업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서기 위해선 당시 영국에의 증기기관과 같은 역할을 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처기업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벤처기업을 통한 창조경제의 구현을 촉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규모 위주의 양적 성장이 한계를 마주했고, 그에 따라 벤처 및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가치 위주의 질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큰 비용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재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기술을 개발 및 발전시킬 수 있음에 따라 4 차 혁명의 흐름 속에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역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벤처창업문화가 매우 열악하여, 혁신하고 창조하는 벤처기업은 법의 장벽에 막혀 내수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는 눈길조차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를 장려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및 사람들의 시선이 그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첫째로는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벤처기업이 마음 놓고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 세대들이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벤처기업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도전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일고 있는 이때에 '벤처기업을 통한 창조경제의 구현'이 침몰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구조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⑤ 김현경(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2016 년 현재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청년실업과 취업난, 2%대의 잠재성장률,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등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는 국책연구기관과 주요 민간연구기관이 모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국가 거버넌스 전반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많은 경제주체들이 새해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11 월 24 일(목)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빌딩 2 층 국제회의실에서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을 주제로 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017 년 IMF 세계경제 성장률 실적치가 대체로 전망치를 하회함에 따라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따라 미국경제는 단기적으로 조세감면,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성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세계경제와 동반 침체 우려가 있어 한국경제는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과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잠재,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고조, 기업 및 가계 부채, 주택시장 리스크 등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자인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환경의 큰 틀에서 일어나는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잘 정립하고 이를 거스르지 않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의 정치·경제 불안의 원인을 국가 주도적 관치경제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귀적, 퇴행적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의 목표전환, 경제적 자유와 복지의 조화, 청년에 대한 새로운 희망제시 등의 변화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인 김종석 국회의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기회를 찾도록 기업 환경의 개선, 세금부담·규제부담의 고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용제도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 근로자,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조속히 국정의 안정과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회복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실무 중심의 창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업률은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이어 닥친 조선업 불황은 노동시장 불안과 연관산업 및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어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2016 년 청년 취업률은 50%를 웃돌고 있고, 청년들의 고용 불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체 오를 줄 모르는 청년취업률과 더불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로도 모자라 칠포, 구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은퇴,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불안이 증대되면서 청년들은 취업보다는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취업 전문 사이트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대학생 및 구직자 726 명 중 71.5%가 창업을 계획 또는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자본이 열악한 청년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에 나서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기초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창업교육'을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대학에는 교양과목으로 '창업교육'이 개설되어 있지만, 이론위주의 수업이 대다수입니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의 병행교육은 물론 창업강좌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 학생을 보내는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창업활동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실무중심의 창업교육을 실시한다면 고용 창출 효과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업, 벤처 역량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1948 년 건국 후 7%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다가 1970 년대 초반부터 1980 년대 후반기까지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 때 이스라엘은 벤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현재 벤처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잠재성장률 2%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은 이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GS 홈쇼핑은 환경 변화에 빠른 대처가 가능한 강점을 지닌 벤처펀드에 출자를 늘리는 등 투자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고 있고, 사물인터넷 기반 실내공기 측정 기술을 서비스하는 '비트파인더(Bitfinder)' 등 스타트업에 억 단위의 금액을 투자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물론 민간에서도 벤처 투자 참여가 증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⑥ 김효정(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수출 부진과 내수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휘청이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가계부채 수준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의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내 상황 또한 좋지 않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숨겨진 비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부는 더이상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한국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11 월 24 일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 위기관리의 해법모색'이라는 주제로 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발제에서 “2017 년 IMF 세계경제 성장률 실적치가 대체로 전망치를 하회함에 따라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진 실장은 “트럼프 당선에 따라 미국경제는 단기적으로 조세감면,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성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세계경제와 동반 침체 우려가 있어 한국경제는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내외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가계소비, 기업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채상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소화 능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여전히 악화될 것입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환경의 큰 틀에서 일어나는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잘 정립하고 이를 거스르지 않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의 정치·경제 불안의 원인을 “국가 주도적 관치경제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귀적, 퇴행적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의 목표전환, 경제적 자유와 복지의 조화, 청년에 대한 새로운 희망제시 등의 변화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단기적 처방을 위해 거시정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가계부채, 연금재정문제, 한계기업 정리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종석 국회의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기회를 찾도록 기업 환경의 개선, 세금부담·규제부담의·고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용제도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 근로자,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조속히 국정의 안정과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회복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기업의 투자를 늘려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IMF 이후 기업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리스크가 높은 투자는 줄이고, 그로 인해 가계와 개인의 소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니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결국은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산업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이 때에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다음 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내수 경제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해지니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더이상 정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고, 그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 정부는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이 아닌, 능력있는 참모들과 함께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성과를 내는 능력있는 정부를 기대해봅니다.

⑦ 유선호(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트럼프가 2016 election에서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8 년간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지속적인 횡보의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경기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 아닌 정체기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영국은 브렉시트라는 결정으로 표출되고 미국의 경우 트럼프가 당선되어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내세운 현상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침체기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순실 게이트과 같은 비리 문제가 터지면서 한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전세계적

경기정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국에서는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망이 어떤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11 월 24 일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 위기관리의 해법모색'이라는 주제로 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발제에서 “2017 년 IMF 세계경제 성장률 실적치가 대체로 전망치를 하회함에 따라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빈 상가만 증가하며 한국경제는 침체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으로는 “보후무역주의에 대한 악영향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한 바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수출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진 실장님께서는“대내외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가계소비, 기업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의 전반적인 부채상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과잉으로 인한 공급소화능력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브렉스트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경제전망에서 경제예측을 실패했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세계적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갈망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트럼프는 비합리적일지라도 감성적으로 끌리는 후보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남훈 교수는 트럼프의 과감한 모습이 경제계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한 과감한 재정정책, 세제개편, 규제완화, 단순화와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트럼프의 당선요인으로 큰 작용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즉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감은 역사적 흐름에 대한 반작용의 수준이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고려가 큰 요인이 되지 못하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관련성에 유의하면서 글로벌 환경의 큰 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걸맞은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미리 구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고도성장의 목표를 이미 이룩했지만 정치는 사회 경제 이 세 가지 모든 측면에서도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김종석 국회의원은 "모든 경제 문제의 뿌리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장기침체 속에서의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셨습니다. 특히 주력 산업의 경우 이 선도 기업들이 동일한 시기 갑작스럽게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데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 외에도 국제적 돌발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세계경제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점차 고조되어 걱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용률 저하 경제활동 저조한 참가율을 원인으로 언급하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제도에 융통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투자유인의 제공을 통해 죽어가는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총체적 경제 위기를 의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⑧ 이권식(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격랑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대한민국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계경제를 표류하는 '대한민국 호(號)'는 격랑(激浪)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선언하였으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위와 같은 대외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국정농단으로 인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내수소비가 침체되었습니다.

더불어 가계부채 리스크, 주택시장 버블 등의 문제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2017 년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처럼 한국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음 지난 11 월 24 일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 위기관리의 해법모색'이라는 주제로 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017 년 IMF 세계경제 성장률 실적치가 대체로 전망치를 하회함에 따라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민간 소비, 민간 투자의 감소 및 불황형 흑자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 모멘팀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대선(大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의 경기대응도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출범하는 미국 신(新) 정부는 단기적으론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세계경제와 동반 침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진행 과정과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의 파급효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양한 대외변수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가계의 소비 및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5 대 주력산업(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의 이자보상배율의 악화 및 높은 부채비율, 1300 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공급과잉으로 인한 주택시장 리스크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의 경제전망을 위해서는 정치적 격변과 사회, 경제적 변화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경제정책의 핵심은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잘 정립하고 이를 거스르지 않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단기적 처방을 위해 거시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가계부채, 연금재정문제, 한계기업 정리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안세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과거와 달리 세계 11 위 수준이므로, 고성장이라는 허상을 쫓기보단 저성장이라는 현실을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인구절벽에서 기인하는 내수경제의 부진과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속되는 청년실업과 취업난, 고용의 질 저하,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소득분배 악화와 부족한 복지재정, 경기침체 장기화와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여러가지라고 생각되지만, 이 모든 경제 문제의 뿌리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에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재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질과 양,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제도, 개방과 경쟁, 총요소 생산성과 기술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경제는 지난 20 여년간 이러한 변수들에 문제가 생겨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기업환경의 개선, 세금부담의 완화, 규제부담의 완화, 고용부담의 완화, 투자유인의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및 혁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기업의 경쟁력 도모를 위해 고용제도 유연화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적신호가 켜진 한국경제, 잠시 멈춰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악재로 인해 한국경제의 미래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였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바로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해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규제로 인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공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한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총리는 "the Jobs Act"(2014.12)를 통해 노동시장의 개혁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고용을 조정함으로써 이탈리아는 경제회복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the Jobs Act"는 3 가지 주요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적격성이 결여된 경우, 노동법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고 통보만으로도 해고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15 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령에 명시된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연차에 따라 근로자 보호 조항이 늘어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환경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들은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 고용규모를 축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고 비용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36 개월 동안 매년 최대 8,060 유로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개혁을 통해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탈리아에서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고요건 완화와 세제혜택이 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주었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44.1%의 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였으며, 17.9%의 기업이 신규 고용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개혁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전체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규직 고용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 년간('13~'15) 이탈리아의 신규 고용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 신규채용은 무려 46.9%가 증가하였으며, 도제(apprenticeship)와 같은 임시직 신규채용과 기간제 계약직 채용은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개혁 이후 청년실업률이 5%p(43%→38%) 낮아짐에 따라, 그동안 이탈리아의 고질병이었던 노동시장 문제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의 성공사례를 확인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많은 EU 국가들이 노동법 수정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유럽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열쇠란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길 기원합니다.

유럽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의 바람을 맞이하는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침체된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노동시장 개혁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시장 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가중되는 고통의 목소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경제문제에 정치적인 목소리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인 목소리는 배제하며, 노사간의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해봅시다!

⑨ 이효은(건양대학교 글로벌마케팅학과)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커다란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 2 의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98 년 IMF 위기 때처럼 부실기업의 연쇄도산 우려가 감지되는 동시에 20 년 전에는 없었던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최순실 게이트'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이 이어지며 2017 년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1 월 28 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 년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예상되며 이는 올 6 월에 내놓은 전망치(3.0%)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때, 한국경제의 상황을 살펴보고 2017 년 한 해 경제를 전망해보는 동시에 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재)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11 월 24 일(목) 명동은행회관에서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을 주제로 제 108 자 월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017 년 IMF 세계경제 성장률 실적치가 대체로 전망치를 하회함에 따라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따라 미국경제는 단기적으로 조세감면,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성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세계경제와 동반 침체 우려가 있어 한국경제는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내외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가계소비, 기업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채상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소화 능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국내의 정치 경제적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환경의 큰 틀에서 일어나는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잘 정립하고 이를 거스르지 않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의 정치·경제 불안의 원인을 국가 주도적 관치경제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귀적, 퇴행적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의 목표전환, 경제적 자유와 복지의 조화, 청년에 대한 새로운 희망제시 등의 변화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단기적 처방을 위해 거시정책을 남발해서는 안되며, 가계부채, 연금재정문제, 한계기업 정리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종석 국회의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기회를 찾도록 기업 환경의 개선, 세금부담·규제부담의·고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용제도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 근로자,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조속히 국정의 안정과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회복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권남훈 교수의 주장처럼 계속되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주도적 관치경제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와 복지의 조화, 청년에 대한 새로운 희망 제시 등의 변화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청년실업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양호한 근무여건의 1 차 시장과 저임금, 열악한 근무여건의 2 차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는 이중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이 구분되는 노동시장 구조하에서는 신규 구직자들은 당장의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1 차 시장으로 직접 진입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미취업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복지 증대는 물론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년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여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⑩ 장정욱(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최근 영국의 EU 탈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글로벌 이슈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어 '소규모 개방경제'로 분류되는 한국 경제는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11 월 24 일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을 주제로 제 108 자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의 임진 실장은 세계경제 성장 전망과 국제 유가, 민간소비 전망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을 진단하였습니다. 특히 대내외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가계소비, 기업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토론자인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불리해지는 세계 경제 여건을 언급하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 권남훈 교수는 사회의 변화 요구를 파악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SNS 의 발달로 정보량이 폭증하므로 부정적 파장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모두 '불확실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의 육성, 그 중에서도 빅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빅 데이터는 IT 기술의 발달로 방대하게 쌓이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언론사가 사용하는 여론 조사 방식에서는 브렉시트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빅 데이터를 통해 나온 결론은 이들을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타인에게 굳이 자신의 본심을 숨길 이유가 없는 솔직한 인터넷 이용 기록을 통해 더 확실한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 침체 중인 주력 산업을 대신해 경제를 이끄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목받는 산업으로 등극한 빅 데이터 산업에 각 국가와 기업들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장기침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빅 데이터 산업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빅 데이터 산업은 미래의 결과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 불확실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빅 데이터가 단지 마케팅과 관련된 의사 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글로벌 이슈들을 대부분의 언론이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낮은 확률로 평가절하했으나 실제로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확한 예측에 성공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빅 데이터는 미래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산업입니다. 범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통해 빅 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입니다.

⑪ 전도훈(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우리나라는 현재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일 계속 보도되는 비보와 더불어, 얽혀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국민들에게 하나씩 표면위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집회는 국민들의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과 함께, 미국의 대선은 매스컴에서의 여론 보도와는 달리,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경제 중심국인 미국의 변화가 예상되어 전세계 국민들은 혼돈의 도가니 속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혼돈 속에서 11 월 24 일(목)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빌딩 2 층 국제회의실에서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 위기관리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발제에서 2017 년 IMF 세계경제 성장률 실적치가 대체로 전망치를 하회함에 따라 점차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에 따라 미국경제는 단기적으로 조세감면,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성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세계경제와 동반 침체 우려가 있어 한국경제는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대내외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가계소비, 기업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채상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소화 능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환경의 큰 틀에서 일어나는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잘 정립하고 이를 거스르지 않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해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의 정치·경제 불안의 원인을 국가 주도적 관치경제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귀적, 퇴행적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2017 년의 안정된 경제 상황을 위해서는 몇가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의 목표 전환, 경제적 자유와 복지의 조화, 청년에 대한 새로운 희망제시 등의 변화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었습니다. 특히 안정된 경제 상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오직 단기적 처방을 위해 거시정책을 남발해서는 안되고 가계부채, 연금재정문제, 한계기업 정리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들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후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종석 국회의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기회를 찾도록 기업 환경의 개선, 세금부담·규제부담·고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용제도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 근로자,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조속히 국정의 안정과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회복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몇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번 우리는 그러한 위기를 극복해가면서 조금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발전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직면하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러한 위기를 잘 타계해나간다면 더 눈부신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서 벗어나,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현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만큼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큰 축 아래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시장경제'의 장점 중 하나는 '회복력'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체제의 나라였다면,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97 년 IMF 라는 경제 위기를 우리는 잘 헤쳐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똑똑한 국민이 제 1 원동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질서를 잘 유지하였다라는 말이 숨어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국민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회복력이 없는 질서 체계에서의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현명하게 잘 헤쳐나간다면 또 한층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⑫ 정영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017년 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4 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요산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수출은 부진하고,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된다면 대외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지난 11 월 24 일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을 주제로 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2017 년 한해 경제를 전망해보고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께서는 한국경제가 2016 년도에 경기순환상 정점을 찍고 2017 년부터는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6 년 성장의 두 축이었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2017 년 경제성장률은 2016 년 2.7%에서 2.5%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업 설비투자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만큼,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나, 2017 년 대선이후 새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확정된 이후로 본격적인 설비투자를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중국경제부진과 서비스 수출 부진으로 마이너스성장이 예상되나, 수출 감소에 따른 수입의 감소폭이 더 큰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순수출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발제자께서는 2017 년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따라 미국경제는 단기적으로 조세감면,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우려됩니다.

또한, 신흥국의 극심한 자본유출입과 환율변동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금융 리스크 또한 존재합니다.

한편, 브렉시트 협상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EU 주요국들의 선거들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대내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의 고조는 단기 경제국면에서도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위축을 초래합니다.

또한, 2014 년 하반기부터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세도 우려됩니다. 향후 전반적인 시중금리가 인상되면, 부채상환 부담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급과잉 우려에 따른 주택시장 리스크도 우려스럽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께서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든 한국 경제는 소국개방경제로써 글로벌 환경의 큰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를 거스르지 않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다한 국가 주도적 관치 경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의 목표전환, 경제적 자유와 복지의 조화, 청년에 대한 새로운 희망제시 등의 변화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처방을 위한 거시정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문제인 가계부채, 연금문제 한계기업 정리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종석 국회의원께서는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들었습니다. 고용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양극화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기업환경의 개선, 세금 부담의 완화, 규제부담의 완화, 고용부담의 완화, 투자유인의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 기회를 찾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세영 교수께서도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청년실업의 이면에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취업의 양적증가 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혁신 클러스터: 집중과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와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있어서 핵심은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일 것입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고용과 생산도 증대되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제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 동안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저조했고 2017 년에도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하지 않아 막대한 내부유보금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투자부진의 큰 원인 중 하나는 4 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하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기술적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성장동력인 미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성장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술혁신을 활성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혁신클러스터”활성화를 제안합니다. 혁신 클러스터란 특정 산업분야와 관련된 직간접적 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어 네트워킹을 경쟁우위로 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활성하고자 하지만, 중국 등 주변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많이 뒤쳐지는 편입니다.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및 유관기관에게 보다 강력한 보조금등의 혜택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또한 어떤 혁신산업에 집중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⑬ 최상연(한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한국경제, 이대로 침몰하게 되는 건가요?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경제부진이라는 늪에 빠져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저성장이라는 여파와 국내외 여러 풍파로 인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안정 되어 있지 않고 기업, 가계, 주택시장 등 곳곳에서 위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국정의 위기로 새 해를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뚜렷한 계획 하나 없이 모두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11 월 24 일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경제가 흔들리며 한국경제도 큰 타격을 맞고 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017 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IMF 가 제시한 것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에 집중하며 한국 경제성장률도 저성장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신정부출범, 브렉시트, 대내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고조, 기업 및 가계 부채, 주택시장 리스크 등 국내외 다양한 위기 요인들, 특히 수출 부진을 지적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이를 거스르지 않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정권 변화기를 맞이하여 국내경제의 변화를 잘 수용하고 반복된 삶에서 벗어나 변화된 비전을 제공하는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종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 기회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던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해가면서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화와 맞물렸기에 시장 충격에 대한 구조적 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안세영 교수는 이제는 저성장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정부재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않는다면 제로성장이 될 수도 있다며 꼬집었습니다. 인구절벽으로 민간 소비는 더욱 줄어들 것이기에 내수 침체가 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이 시급하며, 젊은 세대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내수불황 대비와 더불어 세계 무역시장의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들을 위한 한국의 실리콘밸리 건설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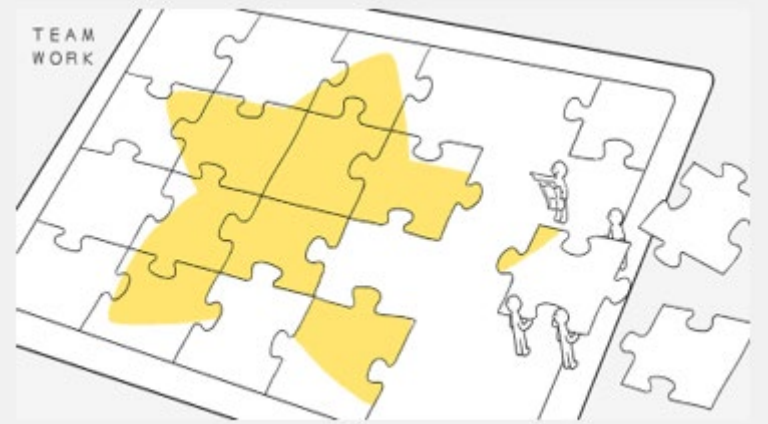
수출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브렉시트, 미국 신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여파로 많은 변화를 겪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 정부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에 한국경제는 계속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 실업이 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를 잘 연결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한국의 '실리콘밸리' 건설을 제안합니다.

정보 기반 시대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4 차 산업혁명 시대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저마다의 생존전략을 도모하고 있는 이 때, 세계 경제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기존 시장에 없던 창의적인 스타트업 회사들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현 시점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미국 각지와 전 세계에서 온 창업자들이 모여 성장해왔습니다. 창업자들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제약에 구애 받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기에,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건설로 한국의 스타트업 회사들을 위한 혁신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실리콘 밸리와 같은 도시에서 나오는 창의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건설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간의 협력을 도모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대기업과 스타트업 회사들 간의 상호 협력을 장려 해야합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들이지만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기에, 기술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스타트업 회사들을 비롯한 중소기업과의 건강한 협력을 이룬다면, 내수가 탄탄한 한국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 시장은 분업이라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이들이 생산을 맡고, 이를 가장 원하는 이들에게 배분하며, 더 잘하는 이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기에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며 시장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분업을 통한 협력은 한국의 실리콘밸리 건설로 더욱 이룰 수 있습니다.

침몰하는 한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회사들을 위한 산업 도시 건설을 바탕으로 기존 기업들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 경제를 다지고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이루어 내면서 하루 빨리 경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⑭ 하성수(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벤처 창업' 활성화로 세계경제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핵심 역량을 기릅시다!

미국 신정부 출범, 영국의 EU 탈퇴 계획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 문제로 인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재) 한국선진화 포럼은 11 월 24 일(목) 오전 7 시 명동 은행회관 빌딩 2 층 국제회의실에서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 위기관리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 연구실장은 2017 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2.5% 성장에 그치며, 취업자 수는 28 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7%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 '영국의 EU 탈퇴 계획'등으로 인한 대내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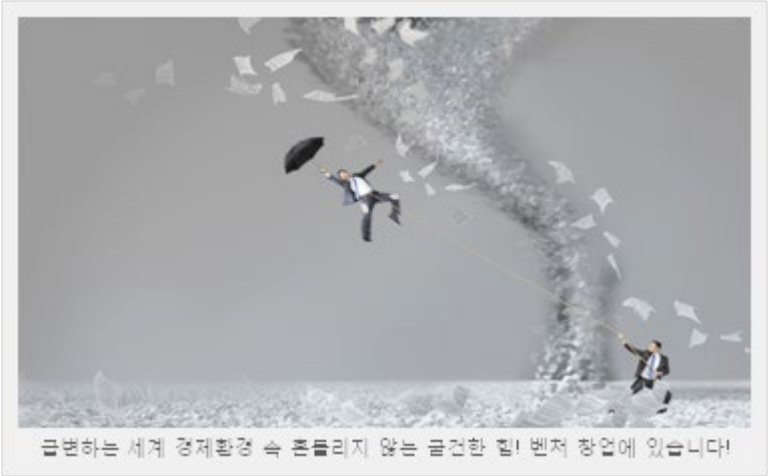
불확실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하며, 기업환경의 개선, 규제, 세금, 고용부담의 완화, 투자 유인의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의 기회를 찾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고용 제도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이 경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 근로자,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조속히 국정의 안정과 경제 위기 대응능력을 회복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대내적 요인보다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좌우될 것이며, 경제정책의 핵심은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잘 정립하고 이를 거스르지 않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권 변화기를 맞이하여 국가 주도적 관치경제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의 목표전환', '경제적 자유와 복지의 조화', '청년에 대한 새로운 희망제시' 등의 변화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던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이용해 생산한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일궈온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규모 8 위, 세계 경제규모 11 위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대외의존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지난해 대외의존도는 69.9%로 미국 21.2%, 일본 30.9%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69.9%의 높은 대외의존도는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흐름에 휘둘리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7 년 IMF,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크게 휘청거렸던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란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은 불안감 속에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뿌리 깊은 나무는 큰 태풍이 와도 뽑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핵심 역량을 찾아 키워야 합니다!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축해야 할까요? 그 답은 '벤처 창업'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경제 속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차별성'을 가져야 하며, 앞으로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교육, 문화, 사회 각 분야에 필요에 맞게 접목이 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고가 '창의성'입니다. 이런 창의적인 사고는 다양한 사람들의 끝없는 도전에서 만들어지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벤처 창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통해 4 차 산업 시대의 인프라를 만들고, 자금과 기술 측면에서 '벤처 창업자'를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부는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과 지원을 통해 '벤처 창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끝없는 도전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만들어 짐을 인지하고 실패에 대한 유예기간을 보장하여 재도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벤처 창업' 활성화를 이룩하여 '창의성'을 갖춘 핵심 역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 전쟁 속에서 생존을 넘어 우위를 차지합시다!

⑮ 김한슬(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9 일,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말, 혐오표현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45 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보호무역주의 회귀 등 중장기적 위험요소들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트럼프의 당선으로부터 얻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요인에 대한 여러 사후적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요인은 아마도 미국인들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요구의 분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CNN 미국대선 출구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그의 '경험'과 '올바른 판단력' 등을 주요 자질로 뽑았으나 트럼프에 대해서는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주요 자질로 뽑았습니다.

이는 비단 미국 유권자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혼란스러운 정권말기를 보내고 있으며, 그 어느때보다 힘든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이러한 시대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누구보다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도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고 있지 않은까?

하지만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내가 가진 작은 습관하나 바꾸기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변화에는 항상 아픔이, 고통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더 큰 아픔이,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조선시대, 세계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발생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진왜란이고 식민통치였습니다. 오늘날 아픈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세계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내적 변화요구에 대처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구조적인 변화들, 구조적인 흐름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틀을 통(通)해 우리의 위치를 잡고, 국내적으로도 소통하여 변화를 추구해나아가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불통'이라면 어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⑯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안정성과 돈,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벌써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때가 다다랐습니다. 2016 년을 돌이켜보면, 경제가 좋지는 못하였습니다. 연초 예견된 저성장 기조는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2017 년의 경제전망 또한 좋지 않습니다. 저성장을 벗어날 확률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2017 년의 GDP 성장률을 2.5%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GDP 성장률인 2.7%보다 0.2% 더 낮은 수치입니다. 소비지출 또한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수경기전망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지표가 부진함과 더불어, 각종 커다란 이슈들로 인해 경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당선으로 각종 시장지표들이 크게 변동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관세 상승을 포함한 보호무역과 금리 상승을 단행할 것이라 이야기한 바 있어, 2017 년은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경제지표를 갖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제지표가 좋지가 않다

또한 대내적인 혼란도 저성장 기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혼란은 국민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데 국가적인 역량이 사용되어 정작 필요한 성장에 사용될 역량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침체의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90 년대 겪었던 '무성장의 늪'을 한국이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장 동력과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이는 유의미한 경고이며,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은 어떻게 해야 일본과 같은 무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클수록 기초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합니다. 한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1)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질과 양, 2) 경제활동 참가율, 3) 경제제도, 4) 개방과 경쟁, 5) 총요소 생산성과 기술수준입니다.



인적자본의 양과 질에 문제점을 짚어보아야 한다.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변수들에 문제가 생긴다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칼럼을 통해 여러분들게 1)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질과 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질과 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의 물적자본의 양을 늘리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물적 자본을 늘리는 대신 사내유보금을 축적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만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 투자를 할 만한 것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환경의 개선, 세금부담의 완화, 규제부담의 완화, 투자 유인의 제공을 통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 기회를 찾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높은 법인세를 유지한다면 이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저출산, 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어서 인적자본의 질과 양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들이 많이지는 고령화 사회가 이미 다가왔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비율이 많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양과 질이 동시에 줄어들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가 대학으로 인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교육은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정석입니다. 그러나 여태껏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너무 높았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대학의 수가 너무 높아, 여러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전반적인 대학의 수를 삭감하여,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등 떠밀려 대학을 가는 청년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수가 너무 많다.

또한 기업입장에서 인적자본의 활용이 까다롭습니다. 기업에게 노동자 1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유연하게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연한 고용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주장은 안 그래도 취업난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의 몰매를 맞을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뀐다면, 비정규직의 월급이 정규직보다 높아야만 합니다. 한국인들이 워킹홀리데이로 많이 가는 호주의 경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시급이 높습니다.

정규직은 안정적입니다. 일을 규칙적으로 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또 일이 주어질지 모르는 불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은 돈도 많이 받고 안정성도 보장됩니다. 이는 잘못되었습니다. 정규직의 혜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에 떠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성과 높은 임금 중 택 1

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람을 사용하는 것에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유연성을 주어야합니다. 단, 같은 일의 경우 임금차이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정성을 원하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으로 정규직으로 일하게 하고 안정성이 없지만 돈을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정규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노동시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윤다영(산업인력 2): 안녕하십니까?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서울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답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건전해져야만 가계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고 기업의 생산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높여 국민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죠.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업이 원하는 경력직 채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좀 더 유연한 근무환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가 나뉘는 등의 근로 탄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빠른 사회의 변화로 인해 이직의 횟수가 늘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연한 근무 환경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안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토론해보려 합니다. 좋은 토론을 위해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수민(산업인력 2):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지금과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고 있고 중소기업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력만 찾으면 신입은 어디서 일하나?'라는 카피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경력사원만을 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경험을 쌓고 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력사원을 원하는 채용에서도 채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경제가 불안해지며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만 개선한다면 노동시장 유연화는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김란경(식물생산 1): 그러나 비정규직은 아직까지 정규직에 비해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비정규직 조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정규직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조교라는 신분으로 인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러한 행태를 벌인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일어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목소리마저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들에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거나 관련법을 제정해나가는 것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조율해나가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노길호(바이오소재 1): 또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성과가 높은 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윤다영 학우께서 말씀하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근로자들이 얻는 이익 또한 기업에서 높은 성과를 얻은 근로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낮은 성과를 내는 근로자들은 도태되고 높은 성과를 얻은 근로자만이 비정규직이라도 좋은 대우를 받고 일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건전한 노동시장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다영 학우가 말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조금 더 보태자면 먼저 당연히 4 대 보험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을 기업 마음대로 계약 해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과가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이 꼭 필요합니다.

임성호(식물생산 1): 보통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나타나는 이유를 기업이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스스로 비정규직을 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도 비정규직 일자리를 통해 얻는 이득이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학업과 병행을 하려 한다거나 직무경험을 쌓은 뒤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 등과 같은 가정생활과 병행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택하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통해 근로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로봇과 기계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도 함께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노동시장이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 주중 자신이 원하는 요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 등 노동 환경이 대대적으로 바뀐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첫 걸음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고 비정규직의 확대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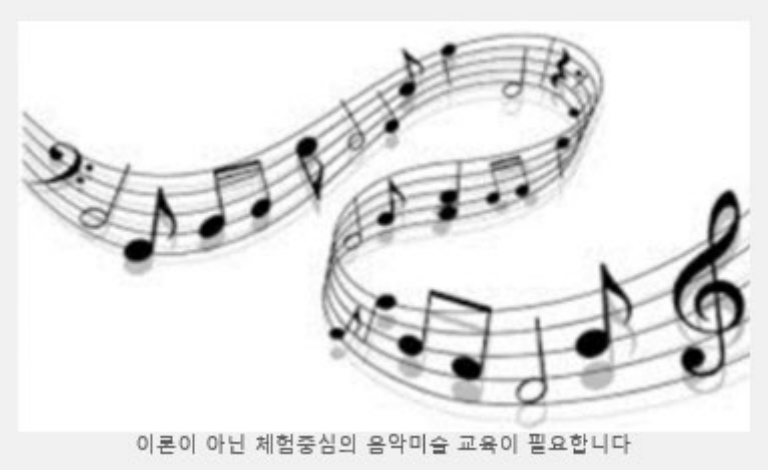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근로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윤다영(산업인력 2):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전부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의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그 대책에 대해 토론했던 108 차 월례토론회로부터 나온 한국경제의 쟁점인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해 어려운 주제였지만 유익한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나뉘어 비정규직 일자리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의견, 근로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의견과 반대 측에서는 아직까지 처우 개선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높은 성과를 내는 근로자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의견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통해 건전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노동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얼어붙은 가계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증대되는 결과를 낳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②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정영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선진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지난 10 월 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실제 문화예술을 통해서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실천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의 융성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착한 선진화의 확산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아름다움과 미적 쾌감은 일상생활에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줍니다. 또한, 타인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여 따뜻한 심성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악과 미술교육의 목적 중 하나도 문화예술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따뜻한 심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로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에,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음악과 미술 수업 시수 확대를 제안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상대적으로 입시경쟁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학교 수업에서 혹은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음악과 미술을 접할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밀려 방과 후에 음악과 미술을 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정규수업시간도 주 1 회로 매우 부족하며, 그것도 주어진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론중심의 수업이 이루어 지는 실정입니다.

음악과 미술 수업 시수를 주 2 회이상으로 확대하여 체험중심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편, 학교에서의 음악과 미술 수업이 지역 봉사활동과 연계된다면, 학생들의 따뜻한 심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는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예컨대, 학교 인근의 소외된 어른신들을 위한 학생들 주도의 작은 음악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체험형 음악미술 교육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이번 선진화 연구모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민(고려대 식품자원경제 4): 저도 정영명 학우의 의견처럼, 정규교육과정에서 음악과 미술 수업시수확대, 그리고 이론중심이 아닌 체험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체험형 음악과 미술교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악미술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인정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떤 학생들은 악기를 다루고 싶어하고, 어떤 학생들은 창작활동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음악 그 자체를 표현하고 싶어하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느낀 감상을 표현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윤채현(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저도 강상민 학우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체험형 음악 미술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한 명의 선생님이 지도하는 수업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수업시간을 늘려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교사중심의 수업보다는 학생들 중심으로 관심분야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음악미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진언(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 2): 저도 윤채현 학우의 의견에 동감하고, 저는 동아리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이를테면,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는 학생들의 음악미술 동아리 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전교에서 똑같은 시간에 진행되어 학년 구분없이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선생님만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음악미술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악미술에서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강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호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 2): 저도 동아리 활동이 체험형 미술 음악교육의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아리 활동위주로 이루어 졌을 때는 단순히 즐기거나 노는 것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아리 활동중심의 음악미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영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 2): 지금까지 제시해주신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체험형 음악미술 교육의 실천방안으로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획일화된 수업을 벗어나 동아리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의 실질적인 운영방안과 보안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 차 선진화 연구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③ 한동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최상연(한동대 컴공 2): 제 4 차 선진화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 월 한국선진화포럼은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 이라는 주제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6 년을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경제부진이라는 늪에 빠져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 또한 2016 년 초 예상되었던 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브렉시트, 미국의 정권변화 등의 여파로 수출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더욱 많은 변화를 겪을 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국정의 위기로 대내외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고조, 기업 및 가계 부채 등 다양한 위기 요인들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개입과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와 혁신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던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기에, 창의력으로 세계시장에 맞설 수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을 지원해주는 한국의 실리콘밸리 건설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미국 각지와 전 세계에서 온 창업자들에게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러한 창조도시를 건설함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건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선교(한동대 생명 2): 실제로 판교에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문화기술, 나노기술 및 융합기술 중심의 연구개발단지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에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와 같이 창업자들을 위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기에 그 성과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설립취지를 잘 이어 나가면 훗날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의 경직된 기업문화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세금만 낭비한 그저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장준규(한동대 생명 2): 실리콘밸리는 단순히 스타트업 회사들을 위한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MIT 랑 하버드와 협력하듯 한국 대학들이 협력해서 실리콘밸리와 같은 단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수업시간에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건설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게, 또 그들에게 큰 메리트가 느껴지도록 재정적 지원이나 뒷받침 할 수 있는 대학이 현 상황에서는 부재해 보입니다.

장주선(한동대 국제 4): 장준규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화 된 기술을 발전시키기에도 바쁘고 쉽지 않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곳에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중공업, 조선업, 산업단지, 연구단지 지역별로 다 따로 있는데 전문화 시키기도 힘든데 합쳐지는 것이 쉬울지 걱정입니다.



스타트업 회사와 기존 기업들 간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황현정(한동대 제품디자인 2): 스타트업 회사들을 지원해줌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연(한동대 컴공 2):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실리콘밸리 건설을 한다면 기존의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각 나라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분업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스타트업 회사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이를 구현한 것을 기업들에게 제시한다면, 협업하는 과정 속에서 잘 중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대기업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먹지 않도록 동등한 위치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다은(한동대 심리 3): 황현정 학우가 이야기 한 것에 동의하며 기존의 기업문화를 개선해 나가면서 하는게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최상연 학우가 이야기 한 협업을 위해서는 공모전과 같이 스타트업 회사들과 기업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연(한동대 컴공 2):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 선진화연구모임에서는 월례토론회 주제인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 에 대해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 기회와 혁신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건설하자는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 결과, 실리콘밸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습니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어 경제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국의 실리콘밸리 건설취지에는 모두들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허나 현재 한국 기존의 경직된 기업문화가 실리콘밸리 건설 취지를 방해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전 지역에 퍼져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곳에 모은다는데 있어서 기술, 시간, 공간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타트업 회사들만 지원해주다 보면 기존의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 건설을 함에 있어서 스타트업 회사와 기존 기업들간의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4 차 선진화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④ 경기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국내외 불확실성의 증가로 한국 경제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

장정욱(경기대 경영) :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제 4 차 선진화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매우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는 정국 문제로, 국외는 브렉시트 등 이른바 블랙스완(Black Swan) 현상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이라는 주제로 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기를 이겨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과 신성장동력 육성입니다. 최근 빅 데이터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 데이터 산업은 IT 기술의 발달로 방대하게 쌓이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에서 선거 결과 예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빅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빅 데이터 산업은 불확실성에 대한 효과적인 예측과 함께 훌륭한 미래 먹거리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빅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제안합니다.



빅 데이터 산업이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안상진(경기대 경영) : 빅 데이터 산업은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 등 관련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빅 데이터를 다루는 신생 벤처 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에스라(경기대 사회복지) : 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빅 데이터를 통해 미리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면 대응방안을 좀 더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 극복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준(경기대 경영) : 통계학보다도 데이터 자체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글로벌 IT 업체들이 이 산업에 큰 강점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과 같은 포털 업체나 페이스북 같은 SNS 서비스는 그 데이터들을 직접 다루는 기업들입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 같은 빅 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기반을 먼저 튼튼하게 갖추어야 근본적으로 빅 데이터 산업의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정욱(경기대 경영) :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빅 데이터는 IT 산업의 기반이 어느정도 갖춰진 환경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존 IT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빅 데이터 산업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하다

박지훈(경기대 경제) : 현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면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선 해양 등 기존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빅 데이터 산업 이외의 다른 성장 동력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차세대 성장 동력을 키워야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정욱(경기대 경영) : 지금까지 빅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논의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빅 데이터 산업의 진흥만으로는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노력들이 쌓이게 된다면 불확실성에 직면해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대학교 제 4 차 선진화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⑤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유선호 (서강 경영 1):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제 4 차 선진화연구모임을 진행하게 된 유선호입니다. 기말고사와 과제에 치여 정신없는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로 위와 같은 돌발 상황이 또 어떻게 불발될지도 모르는 점점 불리해지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의 주력산업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2017 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이라는 주제로 제 108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기침체의 원인을 파악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개혁의 모색을 통해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기업환경과 고용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해봅니다.

서지윤 (서강 경영 1): 우선 기업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투자기회가 저금리 영향으로 투자기회가 제약되고 있어 해외 부문에서 해외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증권 투자할 때의 제약요건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M&A 등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FDI 를 확대시켜 더 전국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기업을 활성화시킵시다

박주희(서강 경영 1): 고용제도가 요즘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직성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여 미래에 있을 시장충격에 기업들을 미리 대비시켜야 합니다.

서은미 (서강 경영 1): 아이디어 뱅크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대학별로 공모전 같은 것을 계획함으로써 대학생들을 창작자로 거듭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자를 연결해 훌륭한 제품이나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신유경 (서강 경영 1): 이를 특히 IT 산업에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은미 학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창업 공모전을 열어 빅데이터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청년 실업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부상할 것입니다.



IT 공모전을 통해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혜진 (서강 경영 1): 뉴노멀 시대에 장기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경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있을 경제적 여파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유선호 (서강경영 1): 이번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에서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기업환경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중심으로 모색하는 것을 주제로 토론해보았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해주신 학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더 성숙한 생각과 제안들이 이 대한민국을 선진화로 이끄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진화 과제 44:

산업주의 4.0 과 한국의 미래

(제 109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김한슬(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대결

이세돌과 알파고의 경기, 다들 보셨나요?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것이라 생각했던 '인공지능(AI)'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게 해 준 중요한 사건이지요.

이세돌이 이길 것인가, 알파고가 이길 것인가?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은 어느 수준인가?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질문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가 아닐까요?


인공지능과 인간,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을 위한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공존이 가능한 인공지능, 인간과 공존이 가능한 로봇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AI 기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뒤쳐져 있다고 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적 사상인 '융합과 통합'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

로봇은 바퀴로 간다, 아니다 로봇은 직립 보행을 해야 한다의 논란 속에서, 평지에서는 바퀴로 가고 계단에서는 직립보행하는 로봇인 휴보를 만들어 낸 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비빔밥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은 밥따로 고추장따로 야채따로 먹는다고 하죠? 다가올 AI 시대 한국인의 정신으로 통합과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인간과 공존이 가능한 로봇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선진화 과제 45:

한국적 포용성장의 구상과 전략

(제 110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서승경(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한국 경제의 방향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현재 계속되는 경제 불안정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성장률 저하를 보이고 있고, 저성장의 지속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장률 전망이 낮다는 것입니다. 2017 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2.5%로서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가계에서도 경제악화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가계부채 위험은 저금리와 부동산경기에 따라 또는 신용대출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나빠지지만 생활물가와 석유류 또한 상승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여파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 장기침체와 닮을 꼴로서 이미 한국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해 일본이 겪은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조금 더 빨리 극복하거나 피해가 크지 않도록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건 현재 객관적인 현상진단과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제, 객관적이 현상진단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현재 한국의 모습은 성장잠재력 저하, 사회구조 균열, 정치구조 균열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장잠재력 저하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 경제 장기침체와 닮은 꼴로서 80 년대 9.4% 성장에서 90 년대 6.7%, 00 년대 4.3%, 10 년대 3.2%까지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급격한 성장 후 저성장은 선진국의 안정화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성장률이 낮은 저성장 경향은 장기경제침체의 길로 들어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구조 균열입니다. '헬조선'이라고 불리울 만큼 소득수준에 비해 불행도가 높고 사회갈등도 증가되었습니다. 실업자 수 100 만명, 청년실업률 9.9%로서 고학력졸업자들은 많으나 많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1 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구조의 균열입니다. 현재 국가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변화, 모든 분야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가 대비하여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해서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를 보이는 한국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노년 부양률이 급상승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지원했지만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잘못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라' 라고 말하기 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성장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총수요를 강화하는 정책을 세우고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합니다. 더불어 계층이동성 제고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서 사람들이 스스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두 번째, 사회 구조를 지속발전가능한 경쟁 프레임으로 재구축해야합니다. 만인이 투쟁하는 국가가 아닌 세분화된 경쟁프레임으로 경쟁적 성과주의를 통해 상생의 조화를 이루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보장시스템과 배분시스템, 융합하는 시스템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부적 정치는 투명성과 책임감 또 법치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정세에 맞추어 변화하고 다가올 제 4 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야만 합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더 이상 정치의 믿음에 대한 후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투명성을 유지해야합니다. 제 4 차산업혁명과 뉴노말 시대에 맞추어 정부에서 투자해야 할 방향을 찾고 4 차산업혁명에 앞서 갈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딛고, 극복해 나아가야할 방향은 '포용성장'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고하게 되고, 정부가 투명한 운영 아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이끌고 간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을 고찰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그런다면 포용성장을 통해 시대에 맞게 좀더 선진화 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② 박현진(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대한민국은 여러상황에 불안정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운업을 일으킨 40 년간의 행보를 보여준 한진해운의 파산, 생활물가 상승과 예상되는 2017 년의 경제성장률은 2.5%, 이것은 모두 대한민국에 닥쳐온 불안정 신호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진단을 해보면 경제구조 균열, 사회구조 균열 및 정치구조의 균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경제사회정치의 균열과 세계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하기위해 새로운 중장기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성숙사회(The Mature Society)' 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공존하면서도 정신적인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시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성숙사회로 되기위해 바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를 추구해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이란 사회구성원 모두 삶의 질 향상, 다양한 불평등 해소및 계층간 형평성 있는 분배를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이 포용적 성장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숙사회가 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선 새로운 인재육성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초,중,고 천편인률적인 똑같은 교육을 받고 정해진 길이 있다는듯이 80%에 육박하는 학생이 대학을 진학합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인재육성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15 년 국제 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에서 발표한 초,중생의 수학과학능력에서 1 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초등생들의 졸업시 PSLE 라는 시험을 통해 중등 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데 이때부터 진로방향이 결정됩니다. 뿐만아니라 수준별 반편성(Streaming)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시험을 통해 중학교를 4~5 년, 고등학교를 2~3 년, 대학교 4 년 과정을 선택해 진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철저한 결과를 묻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쟁적 성과주의와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상생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경쟁제한 계층, 즉 하위계층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새로운 인재육성제도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이러한 사회는 바로 유럽의 한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진국 독일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잘 알려져있습니다. 독일은 중등생때부터 경쟁취업을 할 것인지, 비경쟁 취업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사이의 임금격차가 그렇게 크지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를 '완전고용'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장과 직업은 유연,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여 불신을 해소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주도적인 사회적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근 근로시간을 주당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이 짧은 시간내에 근로자들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습니다. 임금 또한 그렇습니다. 임금이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야만 좋은것은 아닙니다. 개인입장에서는 그게 좋은일일지 몰라도 기업에서는 임금이 생산비입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주도적인 사회적합의가 필요합니다

생산비가 올라가면 사회전반적으로 좋은걸까요? 아닐것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는 서로 어느정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Work)을 하면서 얻는 행복도 사람이 느끼는 행복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고용을 통한 사회적 행복이 증진되는 정책이 요구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독과점적 지위를 얻게되면 별다른 노력없이 초과 소득을 얻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특정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장벽(Entry Barrier)'가 지대 발생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조그만한 벤처기업이 무언가 아이디어를 만들면 그것에 대한 기술을 보장해주는 사회적제도와 그러한 아이디어가 좋은 상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국가차원의 제도적인 노력과 대기업이 이러한 아이디어의 원천을 이용해 대량생산을 막는 벌금제가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이 진입장벽을 뚫기 위한 사회적제도가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복지시스템을 위해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 추구하는 상생 시스템작동, 경제사회 변동에 유연 대응하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구축, 질병, 장애, 노령, 재해, 사망 등 사회적위험으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으로서 그에따른 노동인구 감소및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확대와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주변국에서의 인구 유입효과를 노려야합니다.

'블랙스완(Black Swan)'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 생각했던 유럽인들이 1697 년 흑조를 발견하여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가능성이 없어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상황 속에서 앞에 제시한 네가지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인 '포용적 성장', 바로 이 포용적성장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블랙스완이 되지 않을까요?

③ 서영우(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한국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2017 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2.5%로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 보다 낮은 수치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저성장 기조에 들어설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가계부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에 따른 주택 담보대출 증가가 원인입니다. 이자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서민들은 이자를 내느라 많은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또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진 해운의 부도 이후 우리나라의 호황산업이 줄줄이 위축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에 따라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성장 잠재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한강의 기적과 IMF 이후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는 앞서 언급했던 3%의 성장률도 지키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한국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를 생각해보기 전에 우리나라가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양극화라는 단어로 쉽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입니다. 대기업이 국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고용은 적게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그의 반대입니다. 결국 이 둘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피고용인의 처우 차이는 악화될 수 밖에 없죠.

또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노조의 득세에 따라 경제구조의 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은 점점 낮아지지만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죠.

결국 이는 소득분배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불평등과 노인빈곤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최근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학력별 성별별 임금격차의 지수도 심각합니다.

이렇게 사회구조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좌파와 우파를 나누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류층에 대한 불신과 이유없는 미움이 깊어져 금수저론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출산 고령화와, 트럼프 정부의 등장, 중국의 부상 등 우리나라는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성장률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장만능주의가 아닌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길을 확립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함께 이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수준을 갖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성숙사회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포용적 성장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이 대기업과 소수를 위한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서민들의 총수요를 강화해 균등한 기회와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성장을 지향해햐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 프레임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적 보호계층이 첨예하게 경쟁하고 잘사는 계층 서로 서로 상호 도움을 주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많은 돈을 버는 계층은 그에 따른 댓가로 타인과 경쟁을 해야합니다. 저소득 계층은 돈을 못버는 대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하죠. 이것이 바로 노동 효율성과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큰 방향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고용 중심의 발전전략을 전개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 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복지의 지출 항목을 고용증진 부문에 확대시킨다면 최대한 사람을 쓰면서도 포용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중심에서는 청년 고용이 중요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청년 실업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전까지 국가는 청년 고용에 힘을 써, 미래의 성장의 동력들이 절망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 안전망을 재구축하자는 주장입니다. 위험사회에서 안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재난 방지, 고용창출 성장 등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점이 무분별한 복지와는 다른 점입니다.

네 번째로 경제 체질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상류층들이 불로소득을 얻기 보단 혁신으로 인해 소득을 얻어 국가 경쟁력을 발전시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변동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의 갭을 다양한 전략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글로벌 위기 관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중국의 부상으로한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계 교역량 둔화에 따른 수출 경제의 부진에 대비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경제 리더십을 복원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로 경제부문 역시 마비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에 대응 할 수있는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만들고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한국의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포용적 성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외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로 인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적 포용전략, 즉 고용을 위한 복지, 사회체질 개선 등을 통해 양극활르 줄여야 외부적 위기 상황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④ 송우정(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경제 위기가 사회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초록불이 깜빡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되어 현재 소비·투자·수출 모든 부분에서 부진합니다. 생활물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가계는 위축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증가로 가계부채의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게다가 제 4 차 산업 시대가 바짝 다가온 현재, ICT 산업 서비스업, 광공업의 부진도 성장잠재력 저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및 금융 정책수단의 한계를 느끼고 국가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의 경제구조는 균열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생산액 대비 고용을 많이 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하다보니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는 소득양극화로 이어져 사회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포용적 성장'에 길이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란 모든 사람이 경제적 계층, 성별 등과 관계없이 경제성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 중심 발전이 포용적 성장의 길입니다.

포용이라 하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 전략은 소득을 직접 배분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용확대를 목표로 소외계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용중심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겠지요? 먼저, 정부의 경제개발 예산의 집중 지출항목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부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같이 비경쟁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기업이 많아지면 일할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장 짓기를 포기하고 타국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의 국내생산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 관행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 효율도 높이고 개개인의 삶의 행복도를 높여 사회갈등까지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개인의 능력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용을 늘리고 소외계층까지 포용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기업과 정부 주도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중요한 토대는 '일하고자 하는 개인의 능력과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 4 차 산업에 취약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4 차 산업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 ICT 분야 등을 공부하고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평생학습센터와 미디어를 통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 기업, 정부가 모두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 포용적 성장을 이끌고 보다 빠른 시간 내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계층 간 갈등은 줄고 삶의 질은 높아지는 공동체 행복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⑤ 윤예지(충남대학교 경영학과)



불안정 신호를 보내는 한국경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짐을 떠안은 채, 경제 성장률, 소비, 투자, 수출 모두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출현과 사드로 인한 중국의 압력,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대북 리스크까지. 대외적으로 눈을 돌려봐도 커져가는 불확실성은 우리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든 강구해야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분열된 국론은 병자호란과 같은 어두운 과거의 전철을 밟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다방면의 균열을 막기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모멘텀 확보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어디 없을까요?

이를 위해 제시되는 방안이 바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입니다. 포용적 성장이란, 모든 사람은 경제적 계층, 성별 등과 관계없이 경제성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을 직접 배분하는 형태가 아니라, 생산적인 고용확대를 목표로 소외계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개천에서 용 나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더 중요한 것은 미꾸라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안정성을 이룩하는 것이랍니다.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네 가지의 방향성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려 합니다.



새로운 경제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총수요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총수요는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민간소비는 변동성이 가장 작은 항목으로 오히려 나머지 부분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말이죠.

기업과 정부가 연계해 총수요를 끌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기업들은 경제적 뿐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으로 잠재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땡큐, 삼성"이라며 감사를 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우리는 분명 배울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출발선부터 다르게 시작해 그것이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는, 상위 20%가 80%를 점유하는 2:8 법칙을 고착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작 안전성이 요구되는 하위 계층은 경쟁에 뛰어들고 오히려 상위계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죠. 소득이 낮더라도 안정성이 필요한 것은 하위층이며, 활발한 경쟁을 통해 그 대가로 많은 이익을 가져갈 계층은 상위층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사회 불안성을 증폭시키는 현재의 경제프레임은 기회의 균등과 희생에 상응하는 공정한 배분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개천의 미꾸라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해야합니다. 지대는 보통 진입장벽의 문제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 공공부문, 또는 정부와 국회 규제로 특혜를 받는 이들이 지대수익을 추구하며 경제 발전을 저해하죠.

정부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렌트나 규제를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렌트와 규제 해체를 통해 자신의 대가를 공정하게 가져가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합니다. 복지시스템을 저비용 고효율로 작동시킴으로써 경제발전과 복지향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로 사회안전망을 체계화하는데, 이 때에도 성장은 고용우선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과 소비를 중시하는 "한국적 포용 성장"

수많은 위기 속에서 위 언급한 네 가지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균열된 공동체를 회복해야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끊임없이 싸우는 사회에서 과연 포용적 성장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성장이 절실한 우리는 합의를 통해 현재의 정체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합니다.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복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즉 키움과 나눔이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비로소 국민은 불안을 거두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자꾸 위기의식을 불어넣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역사로 미루어 보건대, 사회 발전에서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은 국민을 결집시키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답니다.

건강한 위기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하나로 모여 포용적 성장에 속도를 내게 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 모습이 아닐까요?

⑥ 정지영(명지대학교 행정학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내에서도 경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 2 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학교 2 학년은 자신과 맞지 않는 전공과 계속되는 경쟁, 기대에 비해 낭만이 없는 캠퍼스 생활 등의 이유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라는 것을 '중 2 병'에 빗대어 설명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열 속에서 고 3 시절을 이겨내 겨우 간 대학에서마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다는 자괴감, 취업을 위해 또 스펙을 쌓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의감이 정이 많은 나라라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향하거나 미래가 안정된 경쟁이라면 의지와 희망이라도 가지며 나아갈 테지만, 우리 주변의 경쟁들은 대부분 그러지 못합니다. 원하지 않는 길에 끌려 가거나 가고 싶은 길이 너무나 험난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리는 없을 것입니다.

경쟁이 필요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경쟁이 없다는 것은 극단적으로는 경쟁할 자유나 의지, 실력이 없는 상태 또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성과를 만들고 서로에게 그 혜택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기술이 있는 분들이 흘린 땀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경쟁 자체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지쳐있는 우리나라가 돌아봐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천재가 아니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위만 바라보는 경쟁이 존재했을까요?

치열한 경쟁은 필요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자신의 의지로 진로를 정한 사람들만 하게 해도 충분합니다.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편견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땀을 흘린 만큼은 서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 경쟁에서 낙오자 취급을 받았던 취약계층에 대한 시선도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멸시받는 약자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일원으로 공존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특정 직업이나 계층이 정해지도록 사회 구조가 정착되는 것은 막기 위해 꾸준한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하루 아침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세계 11 위라는 우리나라가 꿈조차 꿀 수 없는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이미 고착화된 학부모 및 기성세대의 시선은 쉽게 바꾸기 어렵겠지만 교육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거 경쟁식 교육의 선두주자였던 독일도 변화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독일의 교육을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선행학습 금지 및 학생의 진로를 위한 교육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과거 주입식 교육의 선두주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치라는 큰 실수를 범하고 난 뒤에 엄청난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냅니다.

대학에 와서도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초등학교 졸업 전부터 교사가 다양한 유형의 상급 학교 중 어느 학교에 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만큼 단순히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교실이나 학원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넓고 수많은 사람이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러한 방침은 진로 설정 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일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진로를 정하는 것이 부담되거나 더 많은 체험을 해보고 싶다면 여러 유형을 합쳐놓은 종류의 학교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학비 부담이 적은 데다, 학교가 학생의 인생을 존중한다는 인상을 주니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도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길을 보여주어 무의미한 경쟁의 피해자를 줄여야 합니다.

극단적인 차별과 전쟁을 불러일으킨 원인 중 하나로 뽑혔던 독일의 교육도 변화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이라고 변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경쟁의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같은 길을 주입받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길을 찾는 과정이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장인은 그 영역에서 존경받도록 지원하고 제자를 양성할 수 있으며, 예체능을 택한 아이들은 투명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고,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을 보고 자란다면 직업 선택의 폭은 더 늘어나고 경쟁은 줄어들 것입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회의, 교실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 다양하지 못한 장래희망은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고 모두가 가기엔 좁은 길을 다수가 보게 하여 생긴 현상입니다. 비현실적인 교육과 집착을 버리고 나와 같은 다수의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⑦ 김주헌(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계속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이라는 늪에 빠져 국민들의 활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가계와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날이 갈수록 더해져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는 좌절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선진화포럼은 "한국경제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경제·사회·정치적 요인들을 점검하고, 2017 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된 '포용적 성장'을 한국 사회에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제 110 차 월례토론회(주제: 한국적 포용성장의 구상과 전략)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발제자인 김용하 교수는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위축돼 있고, 정부의 정책수단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일본형 장기 침체에서의 탈출을 위해 새로운 경제 프레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를 '완전고용'으로 전환하는 고용 중심의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의 국내생산 여건 조성과 서비스부문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공유 등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스타트업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민간소비를 증진해야 한다

토론자인 김원중 교수는 "포용적 성장은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측면의 성격이 강한데,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민간소비의 변동성이 가장 적다"면서 신산업을 개척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려 민간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민간소비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경우, 규칙이 정해지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른 토론자인 윤창현 교수는 "키움과 나눔이 같이 가야하는 것이고,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면 그것이 상당한 복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의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식 교육제도를 한국에 맞게 적용시켜 성숙사회의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식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발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교육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처럼 입시지향적인 제도가 아닌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단 독일의 교육제도는 이러한 측면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성숙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해줍니다. 이는 기존의 양적인 확대를 추구하는 경제성장, 그리고 이에 의존하는 대량소비사회가 아닌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적인 배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변화를 비롯한 청년고용의 증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차근차근 개혁을 이루어져야 포용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⑧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제 성장률은 나날이 바닥을 찍고, 어딜 가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뉴스를 보아도 지금의 상태에서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보다는 더 나빠질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뉴스 뿐인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한국선진화포럼은 한국경제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경제·사회·정치적 요인들을 점검하고, 2017 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된 '포용적 성장'을 한국 사회에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적 포용성장의 구상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110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김용하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위축돼 있고, 정부의 정책수단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일본형 장기 침체에서의 탈출을 위해 새로운 경제 프레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특히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를 '완전고용'으로 전환하는 고용 중심의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의 국내생산 여건 조성과 서비스부문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공유 등의 필요성도 역설하셨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중 교수님께서는 "포용적 성장은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측면의 성격이 강한데,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민간소비의 변동성이 가장 적다"면서 "신산업을 개척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려 민간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토론자인 윤창현 교수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자리 개혁이 시급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더 나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만들어진 일자리들을 제대로 손봐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은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우리나라지만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야근이나 주말 출근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근로문화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주어진 업무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마치고, 주어진 인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야근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임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출이지만 가계 입장에서는 소득입니다. 가계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겨야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임금을 단순한 '지출'로만 생각하고 최소화하려 하지 말고, 가계에서는 주어진 업무시간 동안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서 효율적으로 일 해 나가야 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일자리 개혁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개혁은 기업, 정부, 가계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구조로는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는 모두가 협상 테이블에 모여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선진화 과제 46:

흔들리는 한국자본주의: 새로운 국민정신을 찾아서

(제 111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서승경(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혼란', 오늘 날과 통일 신라의 모습입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안다'
이 옛말을 아시나요? 이 옛말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쩌면 오늘날 한국 속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은 정부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유한계급들은 이익을 취하면서 서민들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의 힘도 믿음을 얻지 못하여 약해졌으며 언론들과 SNS 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한국의 모습은 이전 우리의 역사인 통일신라 말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 또한 오늘날처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신라의 왕권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백성들은 진골귀족들이라는 고래들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 많은 백성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각지에서 신라 중앙정부에 독립을 선언하고 결국 신라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거의 없어지고 맙니다.

통일신라 말기의 모습, 마치 오늘날의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0 년의 역사로서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한 왕조를 지녔던 통일신라조차 사회의 부패에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즉 오늘날 한국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오늘날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풍류', '접화군생'을 제시한 최치원선생의 모습입니다 .

우리는 최치원선생의 해결책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최치원선생은 6 두품 출신의 인재로, 도당유학생의 자격으로 당나라에서 생활하던 도중, 신라 골품제의 모순점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무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각되어 버리자 최치원은 산속에 은둔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최치원은 골품제를 없애자고 주장할 정도로 시대를 뛰어넘는 시각을 지녔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불선의 통합에 대해 풍류를 말하며 정신적인 개혁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21 세기의 인문정신으로 우리시대에 되찾아야할 격조있는 문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치원의 사상은 무엇일까요?



'조화', 접화군생의 정신적 지향 방향입니다 .

최치원은 먼저, 풍류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풍류는 유불교 세가지 사상이 함께 있던 이 시대에 이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분류보다는 함께 공존하는 조화를 말한 것입니다. 종교들을 기반으로 불교의 자연과 유교의 존중, 기독교의 사랑정신을 함께 이끌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나아가 접화군생정신까지 이릅니다. 접화군생은 최치원이 한 말로서, '접'은 '만나다, 관계하다'를 뜻하고 '화'는 '변한다'는 뜻입니다. 군생은 군중들을 뜻하나 더 나아가 '모든생명'을 뜻합니다.

즉, "모든 생명이 만나며 변한다." 라는 뜻을 지닌 접화군생은 오늘날 사회에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본래의 공동체문화였던 남을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이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심화, 님비주의, 이기주의의 남발은 '접화군생'의 조화정신으로 갈등조정과 완화, 자연과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생, 포용적 성장까지 이끌어 낼 것입니다.

급격한 성장아래 정신적인 토대를 쌓지 못한 한국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토대를 쌓고 함께 올바른 성장을 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무력함은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모두가 함께 일깨워져야지 극복 가능합니다.

우리 본래의 정신적 토대를 되찾고, 이는 오늘 날의 혼란을 해결해 줄것입니다.
'접화군생',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역사 속 최치원선생의 혜안입니다.

② 박현진(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과도한 자본주의는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자본주의의 3 가지 위기라고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바로 경제성장, 사회적격차 그리고 국민윤리의 쇠락인데요. 대한민국은 2011 년 이후 2~3%수준의 저 성장단계로 진입과 동시에 초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의 하락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격차부분에선 어떨까요? IMF 외환위기 이후 분배의 양극화와 격차사회가 수반되어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월급차이는 거의 4 배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교육기회의 격차로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경제적지대추구(rent-seeking)행위 또한 만연합니다. 최상위계층은 자기가 사회에 기여하고 일한 몫보다 훨씬 많은 몫을 챙겨가는데요. 이는 경제관점에서 봤을때 서민층은 더 빈곤에 시달리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는 사회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윤리의 쇠락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만 잘 살면된다는 매몰찬 경쟁주의의 가치관을 갖게되어 국민의 힘으로 인한 구조개혁에 장애물이 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매몰찬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공동체정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접화군생'입니다. 접화군생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접(接)'은 관계성, '화(化)'는 순환성, '군(群)'은 다양성, '생(生)'은 주체가 영성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는데요. 생명을 가까이 다가가 사귀어 감화시키고 교화시켜 완성단계까지 끌어올린다는 공동체정신입니다.

새로운 국민정신으로 접화군생을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첫째로 다가오는 4 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조화하는 마음을갖고 인간대 기계가 아닌 공동체로서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것이 '오래된 미래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지구촌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 자연과 인간이 공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 개발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훗날 미래의 자식들에겐 공원, 아름다운 경치의 산들을 보여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을 같이 함께하는 대상으로 본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접화군생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셋째로 금욕주의의 청교도 정신이 사라져 간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21 세기 자본주의 위기'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접화군생'의 윤리를 서구문명에 융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화군생의 시작은 과거 '콩 한쪽도 나누어먹는다' 라는 속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입거리도 되지않는 콩을 나누어먹는다니, 이것이 아무리 조그맣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가진다는 옛 조상들의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세시풍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설날에 웃어른을 공경하여 세배를 드리고 세배하러 온 손님에겐 술,고기,떡국을 대접하고 다같이 모여 윷놀이를 하고 정월대보름때는 강강술래 및 쥐불놀이를 하는등 마을의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과거 조상들은 세시풍속으로 공동체정신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사조차 나누지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과거 이사를 오면 떡을 돌리고 함께 인사를 나누던 그러한 정겨운 모습이 사라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접화군생'의 실천, 바로 옆집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보는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③ 서영우(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접화군생의 정신을 배웁시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는 계층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으며, 잠재 성장률의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계층간, 세대 간 분배를 둘러 싼 매몰찬 경쟁주의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포용과 조화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잊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고유사상인 풍류도를 토대로 불교, 유교, 기독교 문화가 교체 되며 온 한국 정신문화 유산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길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선진화포럼은 4 월 월례 토론회에서 인문학,경제학, 역사 문화등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어 흔들리는 한국 자본주의를 위해 새로운 국민정신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제적 지대 추구 행위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주제를 발표한 김윤형 교수는 “새로운 국민정신으로 접화군생을 교육시켜 한국의 선진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조업하였습니다. 접화군생이란 제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 정신으로 지구와 자연, 인간이 서로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정신입니다.

접화군생은 우리나라의 정신 문화 유산인 풍류도, 불교문화, 유교문화, 기독교 문화를 접목시켜 포용적 조화 사상에 근거한 공동체 의식을 인간화 시킨 것입니다. 공생의 길을 찾는 접화군생의 윤리는 21 세기의 자본주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정신문화유산입니다.

토론자인 양병무 교수는 천년제국 로마의 지혜를 언급하며 "종교심을 회복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착한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삭막한 현대 자본주의에 정신 유산의 힘이 다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토론자인 이재운 교수는 “최치원의 인간본원 사상을 받들어 현대 사회의 대립을 조화하고 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지만 다시 과거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경제적 지대 추구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독과점 행위는 물론, 제도적 진입장벽을 통해 공공부문 인력들까지 지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다양한 전문직 노조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국회에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으로 일반 국민들을 선동해, 자신들과 관련된 입법을 좌지우지함으로써 원칙이 없는 나라를 만듭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약자처럼 보이고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진 조직들에서 두드러집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들과 일반 국민들의 격차는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에 압박을 넣는 지대 추구 집단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보다는 정부의 무능력을 탓하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접화군생의 정신이 더욱 필요한 것은 상위 1%의 지대 추구하는 집단들입니다. 자신들이 만물과 같이 살아가고 있고, 이들이 존재하기에 자신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일은 줄어들겠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블레스 오빌리쥬,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욕심이 많아 점차 쌓아갈 수록 그것을 가능케한 사회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대 추구 집단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접화군생의 정신을 전파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들이 체리피킹을 그만두고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분노를 잠재우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④ 송우정(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1960 년대 초 빈곤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앞만 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 1 인당 GDP 가 2 만 9,115 달러에 달해 경제규모 11 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국민의 정신적 여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구 비율은 8.8%에서 9.5%로, 독거노인 비율은 18.1%에서 20.8%로 자살률은 21.8%에서 26.5% 등 특히 가족공동체 영역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이기심으로 국민공동체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저소득층이 부유층이 될 수 있는 계층 사다리마저 무너져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과 삶의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이 시대에 포용과 조화의 지혜로 따뜻한 국가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신라에서는 최치원이 그러한 지도자였는데요. 최치원은 사상적인 대통합 운동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당시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던 유불도 삼교사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국민정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삼교의 사상적 뿌리는 풍류라는 도라고 보았는데요.

풍류도는 흐르는 바람과 같은 정신, 오랜 세월 우리의 전통적 의식 속에서 함께하는 사상이었습니다. 흐르는 바람과 같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만물과 접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 풍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1100 여 년이 지난 오늘 날, 한국 자본주의는 신라말과 같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계층사다리가 무너지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정은 줄고 삭막한 개인주의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서로 조화롭지 못하고 공동체 정신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우리나라가 더이상 내부균열로 방황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힘을 모으는 시너지효과가 발휘되어야 할텐데요. 흔들리는 한국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치원의 지혜 '접화군생' 즉, 포용과 조화를 이루는 국민 정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접화군생'의 정신 즉 '공동체 정신'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상 교육과 교실 교육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상 교육으로는 주민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이끄는 것인데요. 어렸을 적, 마을 축제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고 함께 먹고, 즐기며 친한 이웃을 많이 만들면서, 마을 공동체정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역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배웁니다.

마을자치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마을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 공동체성의 효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함께 하는 따뜻함, 함께 했을 때 발휘되는 효율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지역공동체성이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타지역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접화군생'을 테마로 하는 지역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생태체험학습을 통해 '접화군생'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역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포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물과 함께 사는 삶을 주제로 하는 문학작품을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것, 팀빌딩 수업을 통해 협동정신을 배우는 것, 공동체적 장소 혹은 생태체험장소를 현장학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저성장, 저출산, 사회갈등 심화 등 국가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과 조화 정신 '접화군생'을 기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정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⑤ 윤예지(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잊혀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정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나'보다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가족' 같은 표현은 그만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의 공동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이는 우리의 인정문화와 더불어, 과거 IMF 나 새마을 운동과 같이 결집된 국민정신이 필요할 때마다 그 위력을 보이곤 했죠. 하지만 우리의 정신적 문화유산이 잊혀져가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경제성장만 바라보고 달려온 지금에 이르러, 우리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개인주의가 일찍부터 발달했던 다른 나라보다도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5 월 OECD 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 가운데 '공동체 지수'영역에서 주요 38 개 국가 중 최하위 37 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토대는 구축했으나 정신적 삶은 피폐화 되었습니다.

잃어버리고 잊혀진 공동체 의식의 부재는 단지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사회갈등 수준과 소득불평등 수준 최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위기 상황을 고착화시키고 있죠.

우리는 97 년 IMF 외환위기와 08 년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했지만, 분배의 양극화는 확대되고 격차사회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여러 군데가 갈등으로 인해 쪼개지고 민심이 분열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최고 수준의 잠재성장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층이 권력을 내려놓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과연 해답일까요?



공동체 정신은 '국민정신', 즉 '국민윤리'의 힘의 근본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제 111 차 월례토론회에서 흔들리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정신을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인 풍류도를 토대로 불교문화, 유교문화, 기독교문화가 교체하면서 전개되어 온 한국의 '정신문화유산'에서 위기를 극복할 국민정신을 되찾아야합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 리스트는 '정신적 자본'은 정신적 생산력을 견인하며 물질적 생산력도 같이 끌고 나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룬트비 목사는, 독일과의 전쟁 후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른 덴마크에서 '하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우리 덴마크인을 사랑하자'는 정신개조운동을 통해 사회연대책임의식을 전파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족 특유의 '풍류'라는 민족혼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00 여 년 전의 최고의 지식인 최치원 선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접화군생의 풍류사상'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난세였던 신라말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 최치원 선생은 군생을 교화하여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접화군생 : 뭇 생명을 가까이 사귀어 감화,변화,진화,완성,교화시켜 완성단계까지 끌어올린다.

각종 대안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힘들 정도의 갈등 국면에서, 그는 사상적인 대통합 운동을 주장했습니다.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감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사람된 사람으로 교화시키고, 경색되어 있는 종교간의 현실을 삼교가 공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화합을 모색한 것입니다.

최치원 선생이 아슬아슬한 2017 년 위에 서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들리시나요?

과거 신라말 때처럼 대내적인 갈등은 물론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증폭되는 우리는 최치원 선생의 접화군생을 통한 공동체 정신 회복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체화되어야만 성숙한 선진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 국부창출 배분율을 보면 석유, 가스 등 자연자본은 1~3%, 현금자본은 17%인데 비해 신뢰, 준법정신, 도덕성, 기업투명성 및 정부의 효율성 등 사회적 자본은 80%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전통적 문화유산은 선진 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우리만의 문화는 삶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이죠.

정신운동은 다른게 틀린게 아니라는 의식의 전환,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변화를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그 위력이 발휘됩니다.

우리 함께 사소한 것부터 접화군생의 정신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⑥ 정지영(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신은 바로 '융합'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자국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와 생각도 같이 고쳐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대내외로 서서히 고여 가는 어두운 그림자를 제대로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오를 줄 모르는 잠재성장률,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황과 해외 악재, 소수에의 부 편중 만이 우리를 괴롭게 했을까요?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늘어나며 깨어진 공동체, 팍팍해진 삶은 '의지할 곳이 없는 한국인',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의 슬픈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통적 공동체가 깨어지기 전까지 우리를 묶어두었던, 지금은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의 부재가 안 그래도 힘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그 '정신'은 앞으로 4 차 산업혁명을 앞둔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 되어줄 존재가 아닐까요?

분열된 사회를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가치, 정신을 찾고자 하는 바람으로 제 111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불교, 유교, 기독교 등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종교의 공통점을 논하고, 그를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국민정신을 가져나갈지 의논해보았습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그리고 풍류도 모두 '융합'을 강조했습니다.

발제자인 김윤형 교수는 잠재성장률 추락, 제 때 제대로 잡지 못한 사회적 격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낮은 사회의 질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같이 위기를 극복할 공동체 영역이 38 개국 중 최하위라는 통계치를 제시하며, 단순히 경제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정신적 위기 또한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신적 자산 회복을 위하여 민족의 고유 정신인 '풍류도'를 토대로 정신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교의 모든것이 하나라는 화엄사상, 오륜과 인의예지를 강조한 유교,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 문화의 정신들을 모아 접화군생, 즉 생명에 다가가 감화시켜 끌어올릴 때에 우리나라는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정신이 바르게 자리를 잡는다면 앞으로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토론자인 양병무 교수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로마에 종교를 정착시킨 누마 왕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종교심을 바탕으로 법률을 탄탄하게 발전시키고, 정신문화까지 발전한 사례로 볼 때 종교심의 회복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재운 교수는 신라 말의 최치원이 왜 정신문화운동을 전개하려했는지, 신라의 당대 어려웠던 상황을 언급하며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해법, 정신문화로 인한 화합이 필요하다며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진 문답 시간에서 발제자 김윤형 교수는 앞에서의 내용과 더불어,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공동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불의를 참지 못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특성을 언급하며 정신문화교육 성공 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기존의 공동체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정신은 같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 위 국가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살 징후들을 보면 실제로는 '살려달라'는 암묵적인 신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마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공동체 복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60 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과 개발, 환경 변화를 겪어온 우리나라의 공동체 와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통신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뿔뿔히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까지 붙들기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혈연 등의 폐쇄적 일면은 개인화된 사람들에겐 맞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만남이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사이버 공동체는 전통 공동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고 더 다양한 목표를 위해 쉽게 모임을 가집니다. 나이와 지역을 뛰어넘어 서로의 정신을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학습합니다.

비록 그 형태는 조금 바뀌었지만, 다양해진 오늘날의 한국인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묶어주고 정신문화를 퍼트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사이버 공동체가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사이버 공동체를 양지로 끌어올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키워주는 것이 사회 통합을 위한 밑바탕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이버 공동체는 더 다양한 가치를 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동체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넘어 단순히 취미, 종교, 장래희망이 같다는 이유로도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 가족', '~의 직원' 같은 정체성 외에도 '~의 팬'과 같은 정체성을 부여받으니, 한 정체성이 무너져도 다른 정체성을 가진 나로 상황을 견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오프라인의 삶에서 지리적으로 접할 수 없는 다른 지역의 삶과 정신 등을 공유하기 편해져 지역감정 해소와 공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의견을 접하면서 소수의 의견을 이해하는 방법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사이버 공동체는 익숙치 않다는 이유로, 약식이라는 이유로, 범죄 악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이버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은 것일까 의문을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의 종교들이 주는 교훈과 같이 서로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동체는 하나가 된 형태이면서도 하나가 되려는 가치를 전파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휴대할 수 있고 더 기억에 남는 시각적인 자료를 공유하는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맞물려 더 강력해지겠지요.

개인화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혼자서는 그 뜻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접화군생 가치를 품은 개인들이 사이버 공동체에 녹아든다면 이보다 더 자연스럽고 좋은 정신 자산 형성 나눔이 없지 않을까요?

⑦ 김주헌(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경제의 위기, 고민하지 말고 '접화군생'을 통해 해결해보자

대한민국 경제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오르던 경제성장률은 IMF 사태 이후로 그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기에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진이 온 것처럼 흔들리는 한국경제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국선진화포럼은 새로운 국민정신 즉, 접화군생을 통한 공동체정신 회복이 곧 자본주의 위기 해결 방안임을 알리고자 이번 제 111 차 월례토론회(주제: 흔들리는 한국 자본주의 : 새로운 국민정신을 찾아서)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김윤형 교수는 '잠재성장률 추락, 신자유주의 개혁과 글로벌화에 따른 사회적 격차 심화, 국민윤리의 쇠락'을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3 대 위기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접화군생(接化群生)을 통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접(接)은 관계성, 화(化)는 순환성, 군(群)은 다양성, 생(生)은 주체가 영성"이라며 "결국 우리 사회는 포용적 조화사상에 근거한 공동체 의식인 '접화군생'이 있어야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회의 갈등, 접화군생의 역사를 귀감으로 삼아 해결해야 한다

토론자인 양병무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의 냉혹한 경쟁주의가 초래한 격차사회를 직시하고, 계층·세대·이념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문화사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우리 고유 문화인 풍류도(風流道)에 뿌리를 두고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와 조화를 이루면서 도약을 이룩한 전통을 살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교심의 회복을 통해 정신문화 정체성을 높이면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른 토론자인 이재운 교수는 "신라 최치원은 공자의 충효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실천주의, 노자의 무위자연의 인생관, 석가의 권선징악적 교화주의 등의 여러 사상을 융합해 호국정신의 도구로 삼았다."라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최치원이 신라시대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힘을 군생접화의 풍류사상에서 찾아내었듯, 110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해법으로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는 종교다워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저는 새로운 국민정신을 찾기 위해서는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빔밥'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문화는 이미 삶속에 접화군생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파른 성장은 종교에 있어서 큰 부패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개신교를 들 수 있습니다. 1970~1980 년대 양적 성장을 가파르게 한 교회는 거기에 안주하고 그저 종교가 아닌 소위 돈벌이 수단으로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비상식적인 교회들은 여전히 교회를 인수합병을 하고 있으며, 자기 아들에게 목사를 넘겨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정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신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한 불신이 생긴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여전히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는 등 종교의 본질을 흐리는 행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단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역시 접화군생을 통한 공동체정신 회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2 장 31 절에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종교는 종교답게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접화군생'의 기본이자 국민정신 회복을 이끌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⑧ 정영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입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사에서 고도 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 체계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촛불 시위 민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토로합니다. 또한, 희망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층들은 취업난 속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분배를 둘러싼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기우가 아닌 듯합니다. 계층간 사회 갈등과 현 시스템의 붕괴는 앞으로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우려됩니다. 잠재성장률은 지금 수준보다도 더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OECD 는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 전체 파이의 성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분배를 둘러싼 계층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진 계층과 못 가진 계층간의 격차사회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간의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합니다. 공공부분 근로자들과 강성귀족 노조들, 전문직 종사자들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교육격차로도 이어져 세대간의 계층이동성도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윤리정신 또한 붕괴되었습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물질적인 발전에만 매몰된 채,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문화 토양을 갖춰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무너지고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은 모른채 물질만을 쫓는 사회 풍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문화를 정립하고, 가진 계층이 기득권을 내려 놓을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민 윤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포용적 조화사상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접화군생" 정신의 실천이 한국 자본주의에 필요합니다

비록 일제 식민통치와 산업화 과정에서 단절되기는 했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정신은 포용적 조화사상이었습니다. 우리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포용적 조화의 정신이죠. 신라 말 최치원 선생께서도 민란으로 분열된 신라말 시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접화군생"의 정신을 제시하셨습니다.

최치원 선생께서는 "포함삼교"라 하여 유불도의 큰 가르침의 핵심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묘한 도로써, 이를 "풍류도"라 칭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사상에는 통합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접화"란 뭇 생명을 가까이 다가가서 사귀어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교화시켜 "완성단계"까지 끌어 올린다는 숭고한 "공동체 정신" 입니다. "군생"은 뭇 생명만이 아니고 무생명, 인격과 비인격을 막론한 우주만물을 의미합니다.

포용적 조화 사상으로써 "접화군생"의 정신을 국민들 가슴속에 일깨워 공동체 정신을 회복한다면, 한국 자본주의는 성숙한 선진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⑨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개개인이 옴쏠이 졸어져버린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요?

지금 우리는 우리 선조가 이제껏 누려본 적 없는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계층이동의 사다리는 무너져가고 국민 개개인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제 111 차 월례토론회의 발제자인 김윤형 교수는 잠재성장률 추락, 신자유주의 개혁과 글로벌화에 따른 사회적 격차 심화, 국민윤리의 쇠락을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3 대 위기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접화군생을 통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토론자인 양병무 교수는 "우리 고유의 문화인 풍류도에 뿌리를 두고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와 조화를 이루면서 도약을 이룩한 전통을 살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교심의 회복을 통해 정신문화 정체성을 높이면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운 교수는 "최치원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힘을 군생접화의 풍류사상에서 찾아내었듯 우리도 그와 같은 해법으로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매몰찬 경쟁주의를 없애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 모두가 각자의 생존만을 걱정하고 주위사람을 돌보지 않는 현재의 세태도 결국은 '접화군생'을 기반으로 한 국민정신 재무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과거 선조들도 겪어왔떤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는 '접화군생'을 필두로 한 정신재무장으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선조의 '접화군생'을 기반으로 정신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당장 옆에 있는 친구를 경쟁상대,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하는 상대로 보게 만드는 경쟁위주의 교육체제를 개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문화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접화군생의 의미를 교육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경쟁시스템은 효율적이지만 매몰찬 경쟁으로만 가득찬 사회는 구성원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 매몰찬 경쟁만을 앞세워왔던 모습을 반성하고 접화군생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진화 과제 47: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

(제 112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서승경(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오랜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정부가 출현하였습니다.

대통력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가 최근 출범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조나 과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만 이념적 성향의 차이를 떠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에 금번 한국선진화포럼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 이라는 주제로 지난 5 월 26 일, 제 112 차 월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의 의미를 살펴보고 많은 정책적 과제와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였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 '모시는 글' 인용)

발제자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교수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투 트랙 접근을 말하며 경제효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생각하는 분배의 정의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합리적 진보주의가 한 쪽 시각에 치우치지 말며 개혁적보수의 시각이 함께 투 트랙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지배구조개혁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국내투자 유치를 통한 노사관계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언급하며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함께 융화되어서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현대사) 교수는 우리나라는 안보 면에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점으로는 한 정치 권력이 해결 할 수 없기에 협치정치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사회적 공동상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공통적 분모가 없다는 것이 문제의 시발점으로 논의점을 던졌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임기점에 와있기에 이것을 뚫느냐 안 뚫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도약 유무가 갈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윤창현, 강규형 두 발제자 모두 진보와 보수의 융화된 시각으로 나아가는 협치를 말하며 재도약의 기준점 역시 협치에 달려 있으며 여러 기득권세력 간의 협치가 거듭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토론자 김원중(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 선언적인 부분(예: 일자리 80 만개 창출)과 과거 정부와 연속성을 띄는 정책과 차별화를 갖고 있는 정책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먼저, 정규직화에 대한 최근 문제를 논의에 두면서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보다는 "동일노동-동일고용안정화"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항공사 승무원들의 전체 정규직화로 인한 다른 비정규직인원들의 민원들을 다 해결 할 수 없으며, 이는 멀리보아 일자리가 나지 않아 청년실업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자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교수 또한 발제자 강규형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협치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창원 교수는 첫째로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부',
세월호참사와 메르스 사태 및 국정농단 사태 경험으로 떨어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소통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지닌 '공정하고 소통하는 정부',
공공복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요구를 충족시키며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정부',
마지막으로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빈곤대물림이 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정부'에 대하여 언급하며 5 가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의 주제를 놓고 여러 정책들에 대한 방안과 제시를 하였습니다. 비록 다양한 정책과 제언들이 있었지만 이 모두의 공통된 방향과 제안은 '협치 정치'라는 것 이였습니다.

발제자 강규형 교수의 발제 요지를 다시한번 간략히 언급하자면 개혁적 보수세력과 안정적 진보세력이 함께 협치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 이였습니다.

이는 보여주기 방식으로 국민을 매료하기 보다는 협치정치를 통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의 국가적 기능을 보여주며 국민을 보호하고 신뢰를 주어야한다고 말하며 '무능'이라는 정부 타이틀에서 벗어나고 공정한 정부를 이루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한다 말하며 협치정치의 방향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접화군생'의 정신이 협치정치의 브릿지역할 및 공동가치회복방안이 될 것입니다.

발제자 강윤형교수는 논의점으로 협치정치를 이루기 위해 공통적 분모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적 분모로는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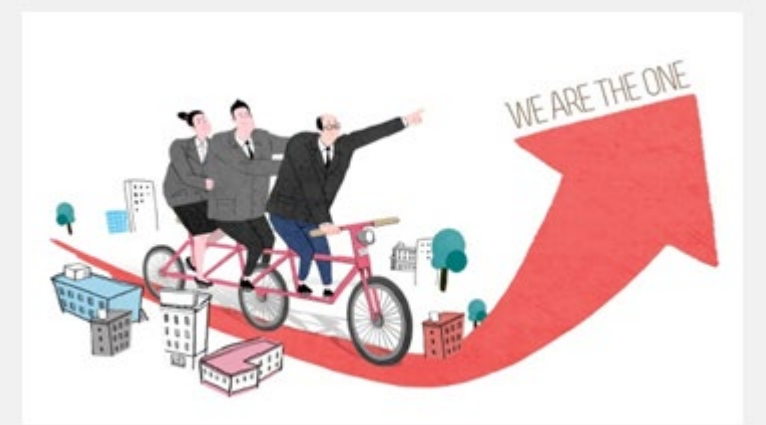
김윤형(한국외대 명예교수)교수는 두 정치세력의 브릿지 역할로서 또 한국 공동가치 회복 방안으로 한국의 정신문화운동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시장경제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빈부격차 속에서 많은 절망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유한계급세력의 책임감도 커져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장이 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야하는 것도 맞지만 고용된 이들의 봉급격차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대우 차별을 완화시키는 것과 같은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 측 변화도 중요하지만 유한계급세력의 배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 환원 제도, 기부문화가 어색한 우리나라인 만큼 정신적문화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본래 기본적인 유불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청교도 정신과 공동체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김윤형교수가 제시했던 '접화군생'은 위의 정신문화 개혁의 토대를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접화군생은 최치원이 한 말로서, '접'은 '만나다, 관계하다'를 뜻하고 '화'는 '변한다'는 뜻입니다. 군생은 군중들을 뜻하나 더 나아가 '모든생명'을 뜻합니다. 즉, "모든 생명이 만나며 변한다." 라는 뜻을 지닌 접화군생은 오늘날 사회 공동가치 회복에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유한계급세력의 변화 뿐만 아니라 두 정치세력의 협치 또한 이끌어 나갈 정신적 토대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새 정부가 도래한 만큼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건 정부도, 국민들도 모두 한 마음입니다.
'새롭다','NEW'는 이전과는 다름을 뜻합니다. 이전과 다름은 없던 것이 등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약간의 변화조차 새로움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으로 협치정치를 통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과 사회적 공동가치의 회복이 중심이 된다면 대한민국 새 정부에 이전과는 다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접화군생’의 정신으로 사회적 갈등조정과 완화, 자연과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생, 포용적 성장까지 이끌어 내고 이에 거듭하여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협심, 더불어 국민 모두가 사회공동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초록불로 나아갈 것입니다.

② 박현진(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작년 하반기부터 대두된 최순실 사건, 그리고 그 주변에 관계된 모든사람들과 대통령탄핵에 이르기까지 2016 년 대한민국은 혼란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혼란은 종식되고 대통령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연 새 정부가 기존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것인가? 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과제와 해결책을 고민해보고자 한국선진화포럼은 5 월 26 일(금) 오후 3 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 11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강규형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은 한 인간의 리더십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과제들이 쌓여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과제들을 열거했는데 첫째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문제, 둘째로 노령화를 동반한 경제저성장, 그 다음으로는 교육의 불균등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말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당면한 이런 여러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치는 필수”라며 좌파, 우파와 같은 정치성향을 떠나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 대화를 통한 의미있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협치는 바른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면서 강규형 교수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불구함에도 아직 대한민국은 협치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없다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임계점에 다다라 추락직전이고 사회적 공동가치 상실이 큰 원인중 하나다" 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원중 교수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관련 인센티브를 민간기업에게 제공하도록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했습니다.

또한 “복지공약 이행에 있어 상당한 규모의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복지의 혜택을 받는자와 비용을 부담하는자가 다를 경우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말을 하며 "최소극대화 기준을 적용해 정부가 사회최빈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창원 교수는 "경제성장/노동시장/사회보장/교육정책 등 모든영역에서 포퓰리즘이난무하고 점점 무책임해지고 무질서하다" 면서 협치는 필수고 새 정부는 야당과의 협치를 지혜롭게 이루어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5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과제를 해결할 열쇠는 올바른 정부역할입니다.

첫째,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몇년간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발사, 천안함피격, 목함지뢰등 여러가지 크고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안전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합니다. 메르스사태, 세월호 참사, 최순실 게이트등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차근차근 회복해야합니다.

셋째, 공정하고 소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않는 자에겐 밥을 주지말라' 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한은 철저히 행사하는 일부 관료들(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되어야합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복지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금, 행복추구권의 실현이 가능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정부가 되어야합니다. 국민들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면 '일하는 복지'가 우선시 될 것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윤창현 교수는 새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10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명분과 실리가 어우러진 투트랙 접근, 4 차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미래성장동력,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민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위기관리,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제도, 내적분열조치, 서비스업의 활성화, 다양한 정책의조합, 글로벌적 시각 그리고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내세운 공약중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더 이상 새로운 인력을 뽑기가 힘들며 알게모르게 이로인해 자신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함으로서 주변에서 거는 기대가 많은 한편, 과연 새 정부가 기존의 정부와 같은 실패를 하지않을까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역설한 협치를 통한 대한민국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구체적인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명분과 실리가 이루어진 투트랙 접근으로 다시 한번 새 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총 임금비용이 늘어나면 안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대체인력을 로보트화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인력난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전체임금비용을 어느 임계점까지 넘어갈 수 없으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봉급을 줄여야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에 상관없이 능력위주로 임금을 배분해야 모르는 사이에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어렵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새로운 것을 하려면 그만큼 용기도 필요하고 힘들다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시작이 어려울뿐이지 하면 생각보다 수월하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협치, 바로 새 정부가 이끌어 나가야 할 시작점입니다.

③ 서영우(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탈권위 정부를 보여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만큼 언론도 연일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국제 정세인 신국가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핵의 위협,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와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합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을 제 112 자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를 발표한 윤창형 교수는 “경제 효율성가 형평성을 같이 추구하는 투트랙 접근, 4 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찾기, 대기업이 일자치 창출하는 성장동력을 찾는 "고 주장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죠.

다른 주제를 발표한 강규형 교수는 "북핵문제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모든 정당이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정당을 죽이는 것이 아닌 협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협치를 할 수 있는 현실인식과 세계관에 대해서 공통분모가 없고 사회적 공통가치를 상실했습니다. 문명사적 흐름에 보면 우리나라는 쇠퇴기에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경제적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반세기동안 경제성장만 달려 온 부작용입니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매몰찬 경쟁주의에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부활시켜야 협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 공동가치를 되살리는 협치에 대한 구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토론자인 이창원 교수는 "새 정부는 국가 안보, 신뢰, 소통, 경제 성장, 고용친화형 복지를 중시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와의 정부와는 다른 길을 밟아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토론자인 김원중 교수는 "새정부에서 과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은 경제 주체를 움직이는 것은 유인인데, 이 유인없이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만들라는 지시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지시란 거죠.

결국 새 정부의 정책은 이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재원 조달 방책이 미비하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4 차 산업 혁명을 제외한 다른 미래 신산업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국내 일자리 정책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공공 부문,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철폐와 기업 쥐어짜내기식으로 마련된다면 이 또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납세자와 수혜자, 이 둘의 범위가 크게 어긋나면 반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역시 공약 세부사항으로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물론 묻지마 예산 삭감, 사비 사용등의 탈권위적인 행동은 지난 10 년 간 보수 세력의 권위주의에 질려했던 국민들이 환영할만 한 행보입니다. 커뮤니케이션적 측면에서 현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잘 캐치한 것이죠. 새 정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신뢰 할 수 있는 정부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으로 쌓아올린 신뢰의 힘은 실제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곧바로 역풍으로 돌변합니다. 이는 실제 공약 이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0 년까지 최저 임금 1 만원, 5 대 비리자 공직제한 등 몇몇 공약은 이미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오로지 새정부의 탓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실제 이행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정책을 보이지 않으면 비난하기 바쁘거든요. 이 때문에 일단 당선이라도 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선심성 공약을 내는 일이 적지 않은 거죠.

이 그릇된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은 공약의 달콤함이 아닌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투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말 뿐인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실현가능성을 철저히 감독하는 기구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같이 각 후보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어느 것이 실현가능한지 국민들에게 판단을 하는 기구죠.

물론 이러한 기구가 생긴다면 중립과 독립을 확실히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도 이 기구가 발표하는 자료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되고요. 각 후보의 선거캠프 측도 그들의 발표자료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각 복지 공약의 달콤함에 눈이 멀어 있고 그로 인한 풍선효과는 짐작하지 못합니다. 공직자들은 투표는 국민의 권리라고 투표 독려를 하기 이전에, 눈속임 같은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공약의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공약의 효율성과 실현가능성을 두고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만,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라는 오명을 벗고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송우정(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5 월 26 일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 11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하며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여러가지 제시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에 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지 경제사회, 국제관계, 안보 등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책적과제에 대해 새 정부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 글을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제자 강규형 교수는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 등을 해야 하며 북핵 위기 등의 안보 문제에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합리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현 정치는 어떠한 세력도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정치 세력들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권한의 위임은 분야별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도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데도 필수적”이라며 분야별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분야별 전문 역할분담과 원활한 소통으로 협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토론자 김원중 교수는 새 정부가 내세웠던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민간부분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일자리 증대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에 대해서는 최소극대화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가 사회 최빈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복지는 한 번 시행한 것을 그만두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후대에 지속적으로 부담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윤창현 교수는 전통산업 일자리를 유지하고 신산업은 성장동력이 되도록 산업분야별 역할을 잘 분담하도록 정부가 이끌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원 교수는 새 정부가 나아가야할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3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정한 나라, 믿음이 가는 정부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그 소망과 기대를 져버리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국민을 지키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위협을 가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자국 문제 신경쓰기도 바쁩니다.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해하지 않게 안전하게 살펴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헌법 제 34 조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지혜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소통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소통하는 정부가 되어야합니다. 아무것도 하지않고 숨만 쉬는 보신주의 모습, 전시행정, 부처할거주의와 같은 모습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헌법 제 11 조에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저계급론과 갑질 이슈가 끊이지 않는 요즘같은 때 모든 사람이 평등하구나 느끼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정부가 나서서 수평적인 소통 정부가 되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태도는 그대로 전이되어 우리 사회 문화를 소통이 원활한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일을 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일하는 행복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는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늘리는 것 뿐아니라 계층사다리를 없애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 정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염원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청년들도 협치에 동참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협치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인재들이 책임감으로 연구하고 제안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자기 관심 분야에 책임을 갖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토론회와 같이 우리나라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태도도 정부에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책임감과 협치, 안보와 소통, 고용중심 복지. 이와 같은 소망 새로운 정부가 잘 실현하여 우리 국민들이 미소짓고 살아가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⑤ 윤예지(충남대학교 경영학과)



국민의 바람 속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최순실 게이트에서부터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최근 우리사회는 엄청난 혼란의 정국 속에 있었습니다.

적폐문제와 함께 자본주의의 위기, 북한문제, 한일문제,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중문제는 한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과제와 해결책을 고민해보고자 한국선진화포럼은 5 월 26 일(금) 오후 3 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 11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자인 이창원 교수는 “현 정치 상황은 어떠한 정치세력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협치는 필수”라며 협치라는 개념이 정치적 수사로만 머물러서는 대중영합주의 정책만 정치적 거래의 소산으로 합의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크게 다섯가지로 제안했는데, 첫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 둘째,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 셋째, 공정하고 소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 넷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 마지막으로는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를 이룩해야함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과거청산과 미래비전이 함께 요구됩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원중 교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 80 만개 창출과 같은 선언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4 차산업 발전,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과거 정부와의 연속성을 띄는 정책들이 있고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를 갖는 정책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윤창현 교수의 핵심은 투트랙적 접근이었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와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가 협치하여 우리가 당면한 과제에 접근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성장동력창출, 민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유인체계를 고려한 정책, 국내 경제의 위기관리, 민관합동적 접근, 저성장기 내적 분열에 대한 조치 마련, 서비스업 살리기, 정책들을 조합하는 문제, 그리고 글로벌적 시각과 노동개혁까지.

이 모든 과제들을 성장과 복지, 키움과 나눔에 있어서 투트랙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할 때, 보다 본질적인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제자인 강규형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 인간의 리더십 또는 한 세력의 역량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

“사분오열된 한국의 국회에서, 합리적 대화와 합의가 불가능한 한국의 정치문화에서, 사회적 공통 가치를 상실한 한국의 사회 풍토에서 협치를 통한 의미 있는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합리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의미 있는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한 많은 국민의 바람 속에 출범한 정부입니다.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의 실현이 좌절된 현실 속에서, 국민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 형태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협치’입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각 분야에서 올바른 국정 운영을 도모할 때, 비로소 미래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는 우리 사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만 달려온 우리는 나만 잘살면 된다는 매몰찬 경쟁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물질문명만 좇다보니 정치적 사회적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됐죠.

하지만 우리의 DNA 속에는 민족 고유의 포용적 조화사상에 의한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진 소중한 정신문화인 공동체 정신에서 협치의 공통분모를 찾아 갈등을 해결해야합니다.

잊혀지고 잃어버린 우리의 정신을 되살린다면, 이 끈끈한 협치는 진보와 보수의 균열을 회복하는 접착제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 성공을 향한 새 정부의 시발점입니다.

⑥ 정지영(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오랜 공백을 끝내고 새로운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탄핵 여파로 인한 긴 공백이 끝나고, 장미 대선을 통해 청와대는 새 대통령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대내외적 악재 덕에 무거운 추를 발에 매단 채 출발선에 선 모양새인데요. 심각해진 국내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소리,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우려만 보아도 그러하지요.

새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여정을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선진화포럼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지난 5 월 26 일, 제 112 차 월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발제자인 강규형 교수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협치는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로 북한 문제와 경제성장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커져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기 전에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 이창원 교수는 이해 대해 정치 세력 간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해 '안전과 안보 책임', '국민의 신뢰', '공정과 소통', '지속가능한 성장', '고용친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토론자 김원중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前 정부와 유사한 방향으로 가는 정책과 차별화를 둔 정책으로 나누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으며,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한다는 점과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어 발표자 윤창현 교수는 '성장과 복지를 잘 조정하는 능력, 마래 성장동력 구축, 민간이 정부에 따를 유인 마련, 가계부채 관리, 민관합동, 내적 분열 처치, 서비스업 성장,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조합, 글로벌 시각, 노동개혁'이라는 8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협치와 소통이 정부를 '새 정부'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는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한국 미래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새 정부를 기존과 '다른' 정부라고 느낄 때는 단순히 야당이 여당이 되는 순간이 아니라 기존의 악습을 끊어내고 미래를 바라볼 때일 것입니다.

협치의 중요성이 여기서 대두됩니다. 우리는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권 인사의 축출, 편가르기 식의 의사결정을 보아왔습니다. 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고,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 혹은 여야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달라진 투표 행태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016 년 4 월 총선 당시 양당 체제를 약화시킨 교차 투표(지지 정당과 후보를 다르게 뽑는 것), 대선에서 크게는 다섯 가지로 늘어난 후보 선택의 폭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독단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세계와 한국은 많은 변수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정당과 인물에 전적인 권력을 주지 않겠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토론회에서도 '협치'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비록 타 진영의 의견일지라도 받아들이는 유동성이 필요하니 말입니다. 국민과 정치권에 모두 열린 소통은 당장의 추진은 늦출 수 있어도 길게는 위기 극복 전략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새 정부는 국민이 빌려준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중심을 잡되,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다른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심도 있는 고찰과 토론을 통한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질 때 드디어 국민은 진정한 '새 정부'를 실감할 것입니다.



협동심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협치가 우리 정치에 자리잡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민이 평상시에 이타적이고 협동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특정 당을 지지하는 이들끼리 서로를 비난하는 행태가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타심과 협동심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보면서 몸에 배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부모가 부모다운 것은 아니기에, 아이들은 단지 자신의 부모가 이기적이라는 이유로 이타심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격과 성격이 결정되는 유아 시기에 협동심을 길러줄 활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자연스레 청소년기에는 타인을, 유권자가 되는 시기에는 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글쓰기, 수 세기 등의 아동 교재들 외에도 인성 발달 교재의 보급을 늘려 많은 아동들이 접하게 해야 합니다. 아동 심리학자 등의 도움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교재 제작을 지원하고 보급하여 가정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교육을 보조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협동과 이타심이 자리잡은 대한민국이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때는 당연했던 사농공상 시절을 부당하게 여기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전제로 삼는 것처럼 미래 세대도 지금의 왜곡된 정당 정치를 구시대의 폐단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⑦ 김주헌(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난 5월 10일, 국민들의 기대 속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지난 5 월 10 일, 제 19 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소 불미스러운 일로 나라의 수장이 없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내치와 외교를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강대국과의 외교 문제, 그리고 청년실업률은 높아지는 등의 위기가 지속되었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5 월 26 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 11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강규형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은 한 인간의 리더십, 한 세력의 역량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면서, "한국사회는 총체적으로 자유통일시대를 준비해나가야 하는데, 현 정부도 이 거대한 조류에 빨리 적응해야 성공한 정부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발제자인 윤창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과 함께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되, 이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 적절한 유인체계를 설계·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윤 교수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데 투자하는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Yozma fund)를 언급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적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올바른 협치를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토론자인 김원중 교수는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보다 민간부문에서 더 많이 창출해야한다"며, "일자리 창출 관련 세금 인센티브를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것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려고 하는 일정부분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 관련으로 "고소득층 또는 재벌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열심히 일할 유인을 감소시켜 경제 전반적인 파이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복지의 대상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최소극대화 기준을 적용해 사회 최빈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토론자인 이창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수사로서의 협치로 인한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지혜롭게 이뤄내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국가 주요 정책입안 및 집행에 있어 권한의 위임은 분야별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 "공정하고 소통하는 정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정부",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정부" 등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여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강조해야 할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지만, 저는 3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국가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국가가 최소한 생명권으로 볼 수 있는 '자연권'과 자유권, (사유)재산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로크의 주장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에 있어, 국민들은 당시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협치'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석이 120 석입니다. 즉, 다른 당과의 협치는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 4 차 산업혁명에 대처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지난 2 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도권을 잡은 미국과 영국 등은 여전히 세계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4 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발전과 도태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있어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는 '마이리틀 텔레비전(마리텔)'과 같습니다. 정부는 관련 기업과 연구소에 4 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판을 제공하여 활발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새롭게 정부가 들어선 만큼 거기에 자연스럽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려우면서 중요한 것이 '기본'입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해결할 문제가 쌓여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⑧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정규직 전환은 현 문제를 가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사람이 먼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출범한 정부는 시작부터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빠르게 취하고 있다. 그 중 사회통합을 위한 첫 과제는 빈부격차해소라고 꼽은바 있다.

새 정부가 지적했다시피,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니계수에 의한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0.48 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IMF 의 고전적 낙수효과 무용론(2015)은 경제발전을 위해 빈부격차를 해소해야함을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해가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빈부격차는 자기가 생산한 몫 이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국의 지니계수. 소득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공정한 사회라면 응당 자기가 사회적 생산에 자신이 기여한 몫만큼 가져가야하고 받아야한다. 그러나 자기의 기여분 이상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생겨나면 필연적으로 자기의 기여분 이하로 몫을 받는 사람이 생겨난다.

기득권들은 그들의 특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 생산에 기여한 것보다 많은 몫을 가져가는 '지대추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제한이나 유리한 구조, 경쟁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대추구 행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대기업 독과점 행위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국회의 의원입법과 특권, 경쟁제한을 통한 의료 · 금융 · 법률 등 지식서비스 산업, 여러 가지 강성노조들의 특권 · 파업 권력과 협상력 등은 모두 지대추구 행위에 이용된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득권으로부터 이러한 지대추구행위를 추구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노동을 통한 격차해소가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지대추구행위를 새 정부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이는 즉 기득권의 이권을 앗는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 직접적이고 급진적인 방법을 통한 변화는 실패하거나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새로운 기득권을 낳을 것이고,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전통윤리의 회복을 통해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득권의 정신개혁을 통한 방법과 간접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추구해가는 방법이 있다. 기득권의 정신개혁은 서양의 청교도 정신에서 귀감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고유의 공동체 정신을 통해 정신개혁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씨앗이 될 수는 있지만, 언제 성과를 볼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정상화. 이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노동시장은 왜곡되어 있다. 같은 노동을 해도 직책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기현상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정규직이라는 직책에 목매고 있다. 정규직도 기득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번 정부가 첫 업무지시로 해낸 정규직 전환은 아전인수라고 말할 수 있다. 기득권을 없애는 것보다 목마른 사람들을 기득권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는 아직 남은 목마른 자들, 앞으로 생길 목마른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단발의 해결책인 것이다.

이번 정부의 행위는 사람들이 역시 정규직이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은 어떤가? 모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만들 것인가?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 정규직이 능사가 아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

정부는 포퓰리즘적으로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꾀하면 안 된다. 노동시장의 정상화는 단지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규직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노동시장, 비정규직이 하대 받지 않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정규직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닌 이를 목표로 사회를 고쳐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할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일의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로 나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일 효과 · 동일 효율의 동일 노동을 할 경우 비정규직이 시급에 있어서 혹은 일급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은 일감이 없을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기대임금이 같아진다.

이러한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변해나간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정규직을 부르짖지 않고 자신의 성향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이라는 기득권을 없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계가 없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진다면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⑨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지난 5 월 초,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대내적으로는 고용지표도 좋지 못하고, 국민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가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도발과 중국, 일본과의 외교문제 등으로 바람잘 날이 없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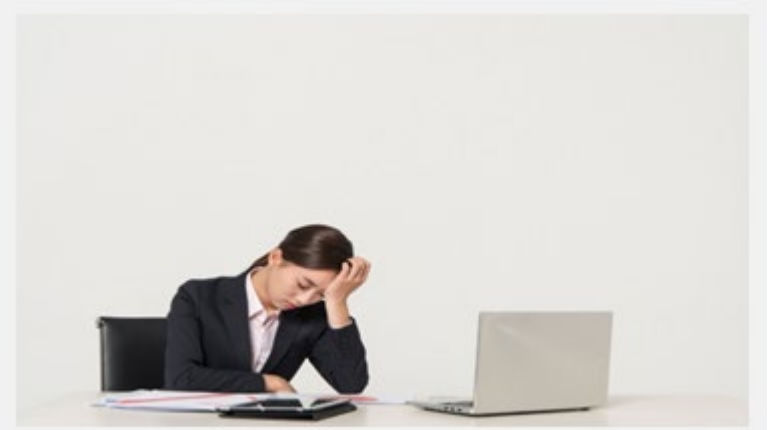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해보고자 한국선진화포럼은 26 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 112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인 강규형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은 한 인간의 리더십, 한 세력의 역량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면서 "총체적으로 자유통일시대를 준비해나가야 하는데, 현 정부도 이 거대한 조류에 빨리 적응해야 성공한 정부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토론자인 이창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수사로서의 협치로 인한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지혜롭게 이뤄내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국가 주요 정책입안 및 집행에 있어 권한의 위임은 분야별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중 교수는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보다 민간부문에서 더 많이 창출해야한다"며 "일자리 창출 관련 세금 인센티브를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것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려고 하는 일정부분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윤창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과 함께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되, 이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 적절한 유인체계를 설계·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전부가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엄청난 임금격차,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는 수많은 일자리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과 임금지불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 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진은 '우리가 불합리할 정도로 적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이 너무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말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말하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너무 긴 상태입니다. 경영진들이 임금을 단순 '지출'로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소수의 인원에게 업무를 나눠 수행하도록 하다보니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은 야근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대신 높은 임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 못지않은 업무강도와 엄청난 업무시간을 요구하면서도 대기업만큼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자체만 놓고 본다면 다른 나라 중소기업과 비교했을 때 임금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을 함께 놓고 비교한다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입니다.

만약 이 임금을 부담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시장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기업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마땅히 소요되는 비용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이 시장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 걸까요?

일자리 문제는 단순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국민들의 지갑이 열려 소비가 늘고, 내수시장을 견인하게 되어 기업들도 더 큰 시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정책도 좋지만, 노동시간에 대해 합당한 임금조차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한계기업들을 모두 정리하고 노동시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정지영 (명지대학교 행정학 4) : 기말고사를 앞둔 와중에도 토론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4 차 토론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즈음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초기인 지금도 꾸준히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협치'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었고, 최근 대내외적으로 많은 악재를 겪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만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협동의 가치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양 당의 다툼을 오랫동안 보아온 국민들은, 한 순간에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정치인들 또한 국민이며 국민이 뽑은 이들이기에 이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모든 국가는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는 말을 떠올리면서요.

공동체 분열과 고착화된 불평등 등을 국민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는 요즈음, 정치인을 낳는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도 협동은 필요하며 점점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자녀 가정이 늘어나고 개인주의가 심해진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협동의 가치를 인격이 형성되는 유아기에 가정 또는 공교육으로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시민과 유권자, 정치인을 낳기 위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인격이 형성되는 유아기에 협동심을 길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시대라지만, 아직은 사람이 실제로 만나는 인물은 제한적이고 일상은 결국 사는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고 살기 마련이죠. 특히 삼면이 바다이고 위는 북한인 육지의 섬인 우리나라라면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처럼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와 혼용되고 지역감정이 심했던 나라라면 이렇게 교육적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대세인 요즈음 부모에게만 전적으로 인성교육을 맡기기도 어려운 실정이구요. 인격 형성기인 유아기에 제도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지현(명지대학교 경제학 4) : 맞습니다. 협동심은 상호유대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사회성을 나타내는 도덕적 관념입니다. 하지만 유아들의 경우, 단순히 사회적 관계를 맺기만 한다고 쉽게 협동심을 배울 것이라 여기면 안됩니다.

유아기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보이는 시기라,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지속적인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 교육과 함께, 그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르쳐 줄, 올바른 가치관의 교육자가 개입해야 합니다.

물론 이 사회에 협력이라는 단어가 자리잡으려면 유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아기가 성격형성과 더불어 사회적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집중적인 교육으로 협동심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협동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두정현(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 3) : 발제가 공감되네요. 요새 협치가 한국 정치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는 국민인 우리의 모습은 협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같은 국가, 환경 속에서 자라도 우리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로만 하는 교육으로는 협치를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협치와 생활 속 협동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통 사회에서 협동심이 강한 친구들을 보면 그 주변 환경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가 많은 친구들이나, 수평적 가정문화,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을 본다던가 하는 경험이 말이나 글로 일률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더 개인의 협동심을 기르기 좋은 것 같아요. 직접 행동하고 경험하는 활동을 늘려 그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 대학에서 실시했던 교양과목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3 명으로 된 조에 매 시간 4 만원씩 배분하는 내용의 수업이었는데요. 서로 돈을 배분하다가 싸우기도 하고,독점하기도 하고,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1 등한 조는 서로간의 끊임없는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조였다고 해요.

남는 만원씩을 모아서 간식비로 사용한다던가, 계모임처럼 순서를 정해 만원씩 더 가져가는 식으로요. 사실 우리는 초중고 12 년동안 협동심을 배웠지만 협동보단 경쟁을 우선시하는 풍조에서 협동에 대한 경험을 거의 해보지 못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서로의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경험을 계속 더해가는 것이 협치를.이루기위한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네요.



김군철 (명지대학교 행정학 2) : 네, 그리고 어릴 때의 교육은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모범 답안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비정상적인 일들이나 하나로 구분지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적인 사회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먼저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교육이 잘 되더라도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마주할 현실 때문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도 좋지만 협동하는 사회를 만드려는 노력이 먼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요새 공동체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안을 주민이 직접 내면, 검토를 거친 뒤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소규모 공동체를 우리 대학생들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민서(명지대학교 행정학 4) : 저도 얼마전에 임대아파트에서 사는 아이들을 왕따시키며 거기에 학부모까지 가세했다는 내용의 뉴스들을 보면서 정치에서의 협치만이 아니라 정치에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하는 국민들, 국가 전체가 협동을 배울 시기가 왔구나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협동이라는 도덕적 영역을 제도화된 교육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힘들긴 하겠죠. 하지만 협동을 위한 노력은 모두가 다방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자체도 비용 효율을 계산하긴 어렵지만 분명 협치와 사회 통합을 위한 자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협동을 일구어내려는 사회의 그 노력하는 분위기 자체가 더 큰 성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경험 문제도 이것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개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니까요.


협동심이 있는 사회, 협치가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영(명지대학교 행정학 4) : '협치'라는 것이 정치라는 현실과 협동이라는 가치 문제가 공존하는어려운 주제인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저는 어디서 협동심을 배웠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네요.

또한, 지난 112 차 월례토론회에서 나온 토론자 이창원 교수님의 '정치적 수사로만 머무는 협치가 아닌, 이제는 필수인 협치'라는 발언과도 행동과 진실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때와 달리 만 3~5 세가 받는 누리교육과정의 5 영역 중에서는 사회관계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이러한 노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협동의 중요함을 일깨운다면 어떨까요?

그 사회의 정치권도 같이 협치를 향해 자연스레 나아갈 것입니다. 최저임금 1 만원 선까지 인상 같은 치열한 대립 중인 문제도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송우정 (평생교육학 3) : 안녕하세요.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4 차 선진화 연구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매우 둔화되고 있는데요. 경제성장률에는 고용창출도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다수의 청년들이 장기 실업에 처해 노동 경험을 쌓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전반의 차원에서 노동 숙련도 저하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경기를 회복하려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소비를 늘려야 할텐데요.

이처럼 일자리 창출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해결 과제로도 우선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 정부는 공공부문 81 만 일자리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112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제언으로 여러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기보다는 민간부문에서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수민 (경제학 3) : 저는 찬성입니다. 아무래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이야기는 저성장이 계속되는 지금 상황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언제까지나 일자리가 생성되길 기다리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자리 늘리기는 당장 시행할 수도 있고 관리가 용이하기도 하죠.

박시현 (행정학 3) : 저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찬성합니다. 공공부문의 인력충원과 노동시간의 단축으로도 일자리 131 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자리는 많아지고 노동시간은 줄면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지민 (경제학 3) : 하지만 그것은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나누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모두의 보수가 조금씩 낮아지게 될 듯한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별다른 대처가 없다면 공직자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박민주 (정치외교 3)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확충 방안이 보수 조정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했을 때도 30 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휴가를 써도 보수는 깎이지 않으니까 괜찮죠.

윤성현 (정치외교 4) : 아까 근로시간 단축한 시간만큼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한 사람이 해낼 일을 2 명, 3 명이서 나눠하게 되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규 (정보사회 3) : 찬성측에서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창출이 너무나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인지가 문제입니다. 공공부문은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신산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시현 (행정학 3) : 맞습니다. 일자리는 기업투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때 그쪽에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부가 억지로 공급하는 경제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박민주 (정치외교 3) :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소비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공부문이라도 일자리를 마련해주어 많은 이들이 일하고 돈을 벌게 한 다음 소비가 점차 늘게 된다면, 기업들의 경영도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 측에서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겠지요.



송우정 (평생교육학 3) : 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이 많이 오갔는데요. 공공부문 일자리의 지속성, 효율성 논의와 현 상황에서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의 한계를 축으로 열띤 토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일자리 창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김수민 (경제학 3) : 저는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려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해야 합니다. 투자를 법으로 막는 경우 때문에 창업가들 또는 기업가들이 쉽게 새로운 사업의 지평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버택시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 부분에 대한 규제도 조금만 조정이 된다면 엄청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주 (정치외교 3) : 일자리 창출관련 인센티브를 민간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는 세금 부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지민 (경제학 3) :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국내로 일부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국내로 가져온다면 더 큰 고용 및 생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윤성현 (정치외교 4) :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청년 포럼, 시민 회의, 공모전 등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시에서의 일자리 아이디어 제안을 위한 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꽤 괜찮은 아이디어들은 일자리 창출하기 좋은 사업 구성안이 되기도 하더라구요.

송우정 (평생교육학 3) : 네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줄이기, 일자리 창출 기업 인센티브 제공, 해외기업 유턴하기,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민 소통 늘리기 등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함께 연구해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이상 선진화 연구모임 마치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선진화 과제 48:

문명사적으로 본 위기관리와 지혜의 리더십

(제 113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여당과 야당은 협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5 월 대선을 통해 선출된 새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야당과 여당이 바뀌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내각으로 구성된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부가 갖춰야 할 리더십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월례토론회 발제자 양병무 교수는 '현 정부가 성공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면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겸손하게 협치하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여당은 야당 시절을, 야당은 여당 시절을 기억하며 소통해야 한다'고 재차 겸손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토론자 김성국 교수는 '로마는 건국 초기부터 적국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후예를 후에 왕으로 세웠다. 또 게르만족을 포용해 그들에게 벼슬을 주는 등 포용정책을 펼쳤다'고 소개하며 개방과 포용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또다른 토론자 김주성 전 총장은 4 대강 수문 전면 개방, 고리원전 폐쇄, 특목고 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대해 '모두 역지사지가 없는 일방적인 뒤집기 정책들'이라며 '정치파트너는 쳐다보지도 않고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독선이 자리잡고 있으며 협치에 대한 여지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말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겠다'는 여당과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들은 엄청난 환호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이전 정부의 불통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 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치인과 대통령들이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선언은 대단히 환영받을 만 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옳은 방향인가 라는 질문에는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항상 국민의 뜻대로 하겠다며 여론을 그대로 따랐던 정치인들은 후에 자신의 뜻과 국민의 뜻을 동일시하여 결국 독재로 빠져드는 과오를 범하기도 하였고, 극단적인 전체주의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는 사회, 분명 환영할 만한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법과 제도라는 틀 하에서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야당이 여당시절에 이뤄놓은 것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제 우리가 여당이니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전면 백지화 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옳지 못한 방향입니다.



공명정대한 기준과 잣대로 이전 정권의 업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지난 정권에 이뤄낸 업적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색안경을 내려놓고 공명정대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른 것은 그 뜻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뜻을 따르되 단순히 인기만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선심성 공약들,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탄핵정국으로 우리나라의 지도부는 공백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상처를 받았고, 국정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새 정부는 이제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라를 이끌 리더십은 결국 원리원칙 안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원리와 원칙, 법과 제도가 바로선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합니다.

선진화 과제 49: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

(제 114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임해린(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포용적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현정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IMF, OECD, 세계은행 등이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이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현 정부가 제시한 '포용적 성장'의 기저에는 정부가 의료/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밑바탕에 깔아주면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 소비 증가와 내수수요 확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 정부는 지금까지 분배의 객체였던 가계를 성장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한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최저임금 인상안 역시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을 둔 대표적 정책입니다. 정부가 16.4%에 해당하는 역대급 시급 인상률을 제시한 이유는 소득을 높여 소비와 생산,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가 현정부 주요 정책 목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일자리창출, 소득분배 등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예산정책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존재합니다. 정책이 분배측면으로 편중되어 국가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키울만한 정책이 빈약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온전히 국가의 운명을 맡기기엔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못하고 최저임금제도가 취약계층의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써 제대로 작용할지 오히려 시장질서를 무너뜨려버리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도 의심어린 시선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독립적인 문제로 보는 경제학의 시각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대체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역시 존재합니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구도 프레임으로 규제의 대상은 시장과 자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은 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로 한정짓고 있다는 점은 자유시장경제체제하 지나친 정부개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분배에 관한 정책뿐 아니라 성장에 관한 정책도 필요함.

가계부채율이 날로 높아지고 또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내수시장을 잡아보려는 정부의 노력과 저성장 양극화 해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신중히 지켜보아야할 문제일 수 있지만, 촛불 민심에 힘입어 출범한 정부이니 만큼 국민전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대안을 고르기보다는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자칫 빠져버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제란 큰 제어의 필요 없이도 자연스레 흐르는 물과 같아 정부주도하의 지나친 개혁이 가져올 부작용 역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많은 복지정책을 감당할 재원은 충분한지 혹은 무리하게 국가부채를 끌어와 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노동측면만을 강조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이끌어야할 기업을 정책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부정책의 저울이 기울어질 상황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야당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지난 정권에서의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고 무엇을 위해 나아갈지 그 방향성을 다시 바로잡지 않는 이상 이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혁을 위한 협치가 필요함

정치란 본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인기에 영합한 정책들에 벗어나 거시적인 틀에서 바라보며 정책을 내세울줄 아는 합리적 진보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나갈줄 아는 개혁적 보수의 협치는 정책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하고 돕는 정책보다는 지속적으로 자립성을 키울 수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 정부지원위주의 정책보다는 대기업이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 아닐까라며 감히 제언하며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② 김나연(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일반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이로 인해 내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찬반 논쟁의 화두로 떠오르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제도와 일자리 확충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최저임금은 6470 원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0 년까지 이를 10000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2020 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 만개 창출과 공무원 17 만 4000 명 증원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한국 선진화포럼의 월례토론회에서 건국대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 그리고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윤창현 교수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권남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기조를 '규제, 보호, 및 정부지원'으로 요약했습니다. 우선 현재의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대상은 시장이고 보호의 대상이 중소기업과 노동자이기 때문에 성장 우선보다는 분배 우선을 내비치는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경쟁'의 뜻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즉, 공정경쟁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정경쟁을 훼손하더라도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동근 교수 또한 마찬가지로 큰 정부론을 비판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는 슬로건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즉 고유의 재원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는 무언가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대착오적 사고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최적임금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승률이 저조한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분배할 파이(pie)가 없는데 분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부를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16.8월	'17.5월	6월	7월	8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증감, 만명)	38.7	37.5	30.1	31.3	21.2
비농림어업	45.4	37.2	28	28.8	19.3
비공공행정	32.3	35	27.7	28.8	13.7
고용률(%)	61	61.3	61.4	61.5	61.1
청년층(15~29세)	42.9	43.4	43.1	43.8	43.1
(25~29세)	69.7	69.8	69.4	69.2	68.7

<자료=통계청> <그래픽=홍종헌 미술기자> 뉴스핌

일자리 성장 정책, 실질적 일자리 증가 효과는 미비

마지막으로 윤창현 교수도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가 인상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상이 민간고용을 감소시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을 40 여년간 관찰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100 개가 늘어날 때 민간부문 일자리가 150 개 줄어들고 실업자는 더 늘어난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도,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선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정규직 임금을 동결 혹은 인하하고 기업의 추가고용 여력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권남훈 교수, 조동근 교수, 그리고 윤창현 교수는 공통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오히려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단기적인 분배 효과만을 기대한 정책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증대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동근 교수가 언급한 것과 같이, 분배를 할 파이(pie)가 없는 상황에서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 내수 시장은 더 수그러질 것입니다. 일자리 증대를 위한 지원책은 노동력의 질을 떨어트리고 시장의 고용 창출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편의점에도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잘리고 사장이 대신 일을 보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분배 정책은 반대 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인세 인하하는 미국

또한 분배를 위한 법인세 인상은 결국엔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토론의 사회자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법인세를 인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 미국의 트럼프는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인하한 점을 같이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시장의 고용창출 능력과 소비자의 소비지출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만 한정되는 정책을 확대시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실질적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③ 박성준(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2016 년, 2017 년, 대한민국 전반에 만연한 정경유착의 문제가 대통령과 주변인물까지 연관되자, 우리는 18 대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었고, 금년 5 월,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와 더불어 급박한 선거를 통해서 19 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장기집권하고 있던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권력이양도 동반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 다양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박했던 선거로 행정부처의 인수인계에 난항이 있었고, 정권교체의 부작용으로 기존의 잔존세력과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진행하고 있고, 선진화 포럼 제 114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선진화 포럼 제 114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및 경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종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현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을 정리하여 크게 분류하자면 총 4 가지이며, **(1) 소득주도형 성장, (2) 일자리 중심 경제, (3) 공정경제, (4) 혁신성장**으로 경제정책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주도형 성장 : 가계를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여 소득증대 노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시급을 1 만원까지 상향시키는 것과 더불어 핵심생계비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안정망을 확대하고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핵심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 : 임대주택 확충,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 통행료 인하, 통신비 인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의 강화

(2) 일자리 중심 경제 : 고용 없는 성장과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의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일자리 중심 예산, 세제, 정책, 금융을 재설계함과 더불어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확충합니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부담을 강화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기업 일자리도 늘리며, 직업능력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합니다.

(3) 공정경제 :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보상체계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갑·을 문제의 해소, 하도급·가맹점 등 불공정한 경제행위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같은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의 강화, 복합쇼핑몰 영업의 제한 및 골목상권 보호의 강화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4) 혁신성장 : 경쟁제한적 제도에 대한 혁신 및 혁신적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고, 중소기업 전용의 R&D 를 확대 및 중소기업 네트워크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4 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 정책으로 가계부채의 관리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 물가 및 각종 요금의 관리, 재정의 선도적 투자의 확대 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경제철학은 100 대 국정과제의 3 번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힘든 경제적으로 상황에 쳐해져 있으니, 해당된 인원에 대하여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제약자에게 좋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일자리와 임금수준은 기존 시장경제에서 책정되던 일자리와 임금수준과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사기업의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래의 일자리를 지금 땡겨 쓰는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위적 일자리로 인해 미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 높은 임금수준으로 국가와 기업에 각종 재정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오늘날의 포퓰리즘적 행태는 유럽과 남미의 과거 복지병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맛 본 복지를 다시 축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국민은 더욱 나태해지고 국가는 더욱 빈곤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다소 밝지 못 한 전망의 경제정책이 다수이지만, 이는 급반한 선거와 정권교체의 여파로 충분한 정책설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소득주도형 성장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언급하여 해당 경제정책이 수정될 것임을 예고하는 등, 현 정부가 다수의 경제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도 감안하여 앞으로의 경제정책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④ 이서현(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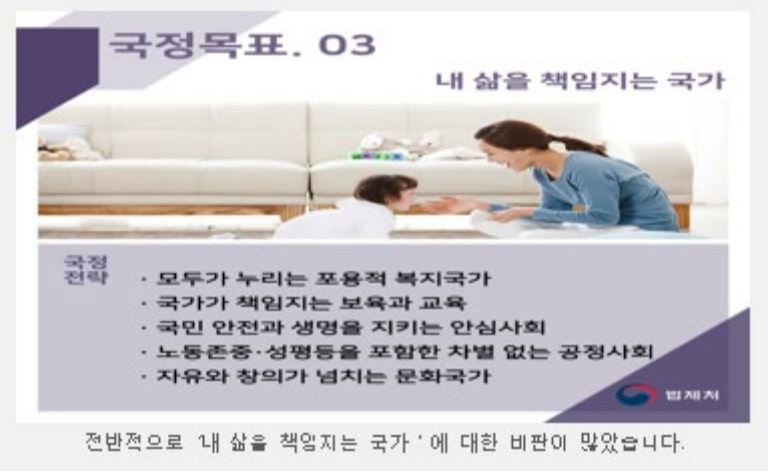


문 정부가 출범되고 경제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해,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뿔난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었습니다. 그 결과 헌정사상 첫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민심을 이어받아 올해 5 월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 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삶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문 정부의 변화들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선진화포럼은 9 월 23 일(금) 오후 3 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하여 제 11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주제발표자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100 대 국정과제에서 '내 삶을 책입지는 국가'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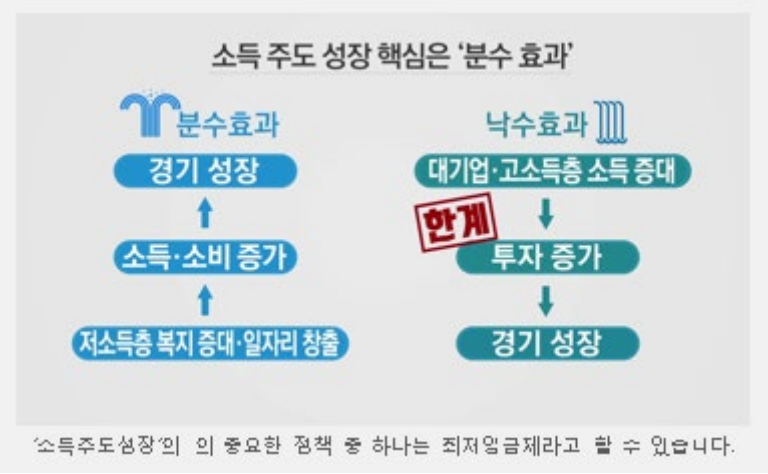
그리고 분배로 성장을 하겠다는 철학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중 조세정책에서는 법인세의 인상, 예산정책에서는 과도한 복지팽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시장가격의 정부개입에서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을 크게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나누어서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자각과 고려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남미에서 유행한 좌파 포퓰리즘적 정책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행태를 "국가가 '최대의 고용주'가 되어야 하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며 "정책선택과 관련해 '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사려깊음과 신중함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자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순환구조를 설명하며 비판했습니다.

"생산물 수요가 늘어나고 성과가 좋아져야 요소시장(노동시장)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 요소수요부터 늘어나거나 임금부터 증가하는 것은 앞 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하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임금부터 올리는 것은 생산비만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제가 이번 정부에서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 정부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6~7%에 머물렀던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매우 저조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8 년도에는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를 인상한 7530 원으로 제고했습니다. 이는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1 만원 시대에 대한 첫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6~7%의 인상률과 달리 갑자기 16.7%의 급격한 상승은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은 시애틀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애틀의 경우, 최저임금을 3 년간 $9.47 에서 $15 로 대폭 인상했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첫 2 년간의 인상($13)결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3% 인상되었으나 노동시간은 9% 감소해 결과적으로는 전체 소득이 감소했었습니다.

이처럼 시간 당 임금은 늘어날 수 있으나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결국 임금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갖는 고용주들이 인력을 축소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애매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보다 큰 범위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매월 1 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여금같은 경우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연봉 근로자들도 시간당 최저임금 규정에 걸려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평균 연봉이 6700 만원이고, 신입의 연봉도 4000 만원 이상으로 고연봉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임금의 40% 이상은 상여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일부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대 중공업 외에도 많은 국내 제조업체들의 상당수가 비슷한 형식을 띠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세금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받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세금으로 인상분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에만 3 조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번과 같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매년 더욱 더 많은 세금이 요구 될 것이고 그 결과 증세 혹은 다른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들이 증가할 것 입니다. 2012 년 이후 꾸준히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증가하여 2017 년 현재 전체 근로자의 16.3%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6~7%정도 인상했던 과거에도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번처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경우가 지속된다면 그 비율이 더욱 급증하여 결국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나 다양하게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남과 대구 같은 경우는 전체 근로자의 약 20%정도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임금이 증가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증가로 돌아가기보다는 고용주들이 위법자가 되어 근로자의 임금은 그대로, 고용주들은 위법자로 만드는,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최저임금제를 지키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 보다는 물가와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인상률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지키도록 법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등 제대로 모든 수당을 챙겨주는 곳이 많을까요? 분명 그렇게 다 챙겨주는 곳은 드물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모든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키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과 조사를 강화하여 근로 수당을 지키게 하고, 잘 지키는 곳에는 세금을 인하하는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이 우선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봉이 4000 만원을 초과하는 고연봉의 근로자도 상여금 형식의 임금제공 방식에 의해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도 좋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무조건 펼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눈 앞의 행복을 위해 미래에 위기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에게 꿀만 가져다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면 안됩니다. 쓰고 맛없으나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약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야할 것입니다.

⑤ 장영임(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그 후, 나라를 다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이 때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정국이었던만큼 지난 정권에 비해 단기간에 많은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문제인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 11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현진건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100 대 국정과제"로 삼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 삶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지 국가에게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토론자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큰 정부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토론자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직은 정권 초기여서 방향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에 기반합니다. 최저 임금 1 만원을 달성하여 가계가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의 늘려 경제 성장의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모토를 내걸어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계층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실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많습니다. 현재 급격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은 분명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정부들은 대개 매년 최저임금을 6~7%정도 인상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무려 16.4%에 달하는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정책이 정부실패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더 나아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요즘의 취업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경우, 그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람에게는 좋은 정책입니다. 비정규직을 뽑아 손쉽게 인력만 착취했던 기업의 행태를 뿌리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업을 다 정규직화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비정규직은 본래 정규직으로 쓸 필요는 없는 경우 임시 고용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정규직화한다면 불필요한 비용들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비윤리적인 기업의 노동 착취와 불공정한 대우입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민생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무능했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민생에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이제 정부의 향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생을 돌보는 데 있어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지가 될 것입니다. 아직 시간도 많고 갈 길도 멀기 때문에 더욱 탄탄하고 성공적인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 머리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⑥ 장준우(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다양한 경제 정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 년 말,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조종하는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끓어오른 민심은 광장의 촛불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습니다. 이윽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차기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 개월 여가 지난 상황에서, 문 정권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비정상의 정상화'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 정권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통신비 인하. 탈원전, 법인세 인상, 복지지출 증대와 같이 새로운 방향의 경제적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 정책들은 작게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와 미래의 청사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정책중에서도 경제 정책은 무턱대고 실시하는 것보다 사전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선진화포럼 제 114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경제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계신 네 분의 교수님들께서 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발제자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문 정부의 경제철학이 개인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개인을 책임진다'는 문 정권의 철학은 사회주의에 가까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문 정권은 이러한 국가적 정체성의 근간을 뒤흔들어놓는 위험한 경제 철학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 전 원장은 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 역시 '생산한 것 이상으로 분배할 수 없다'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한 채 성장과 분배의 인과관계를 뒤바꾸어버렸다며 그 실효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 전 원장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해서 밀고나간다면 경제학자 애쓰모글루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지적한대로 경제적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며 개인들의 창의력 역시 사라져 성장 동력이 전혀 없는 죽은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전 원장은 문 정권이 제대로 된 경제 철학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철학적 바탕이 부재한 원인은 맨큐의 교과서로 대표되는 주류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또 이를 알고 싶어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문 정권이 경제학 교과서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체득하고, 상호 경쟁하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권남훈 교수는 문 정권의 경제 정책이 시장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문 정권이 과거 아르헨티나와 같이 남미에서 유행한 좌파 포퓰리즘적 정책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포퓰리스트 정권들은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무시한 채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펼쳐 가난한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혀 국가적 위기를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 또한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허구라며 문 정권의 경제 정책은 국가가 개체 위에서 군림하는 파시즘적 전체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통렬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즉 자유주의적 사상 하에서 개체가 없다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으며, 각 개인들이 서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국가가 오히려 개인을 책임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조 교수는 최저임금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문 정권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 두 가지의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정권은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와 그에 따라 최저임금이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교수는 이와 같은 문 정권의 기대가 현실과는 다르다며, 급격한 폭의 인상이 오히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문 정권이 무턱대고 정책을 펴 나가기보다는 그에 앞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경제학의 한 학파로서 학문의 차원에서 '담론적 성격'으로 논의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경제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정도로 확고한 논리적, 경험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문 정권이 나라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동요하는 대중들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정책을 핀 나머지, 큰 그림을 조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일자리 증대 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데, 이러한 인상이 오히려

기업의 민간고용을 줄이면서 전체 고용을 위축시켜 공공일자리 증가의 효과를 상쇄해 버릴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요컨대 윤 교수는 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당장은 인기를 끌겠으나, 먼 미래에 포퓰리즘의 대가로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발제자인 현 원장과 토론에 참가한 세 분의 패널 모두 문 정권의 경제 철학과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효성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의 시기는 국제적으로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고, 4 차산업혁명의 시대가 옴에 따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경제가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위시한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나라는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이상의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얻어진 결론은 '국가의 지도자는 올바른 경제 철학을 가져야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올바른 경제 철학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지도자와 경제 정책 담당자들 스스로가 포퓰리즘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올바른 정치 철학과 경제 철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을 들 수 있습니다. 1960~70 년대의 영국은 노동자들의 권익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베버리지 보고서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복지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개인을 책임진다는 것은 자유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노조의 과도한 권력으로 노동생산성 하락, 만성적 파업, 과도한 복지 문제와 같은 영국병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강성노조와 노동당 세력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한 번 상승하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띠기에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시도는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대처는 이렇듯 영국병으로 인해 영국 경제가 점차 몰락해가고 있음을 간파하고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강성 노조를 탄압하며,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러한 대처의 노력 덕에 영국병에서 탈출하여 다시금 경제적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처는 신자유주의를 복지병을 타개할 수 있는 상식으로 여겼고, 이를 단호하게 시행하여 영국을 위기에서 구해냈던 것입니다. 대처의 개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녀가 '상식'을 무엇보다 강조했듯이, 올바른 경제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굳건한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처가 집권하기 전까지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와 같이 얼핏 보면 매우 매력적인 레토릭을 가지고 포퓰리즘 정치를 계속해왔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곧 국민이 열심히 살지 않더라도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말이었고 이에 대중들은 열광했죠.

그러나 이는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개인을 책임진다는 미명 아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합리화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대처는 이와 같은 국가의 과도한 복지가 자신의 정상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임을 깨닫고 단호하게 개혁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상식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펴 영국을 위기에서 구해 낸 대처와 대조적인 인물로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를 복지병의 수렁으로 빠뜨린 페론을 들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었던 후안 페론은 매년 20%에 달하는 높은 임금 인상과 과도한 복지 정책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였습니다. 이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더 많은 복지를 원하고 일을 할 의욕이 떨어져 노동생산성이 하락했기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피폐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듯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비슷한 유형의 복지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국은 대처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 복지병에서 빠져나와 재기에 성공하였고, 반면 아르헨티나는 페론의 포퓰리즘 정책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얼마나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국가의 운명은 지도자가 얼마나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문 정권이 추구해야 할 경제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앞서, 그 정책의 기반이 되는 올바른 경제 철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업과 달리, 정부의 경제 정책은 철저히 성공만을 바라보며 실패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는 보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경제 철학이란 소득주도 성장론과 같이 다소 큰 위험성을 가진 실험적인 정책이 아니라, 많은 선진국이 오래 전부터 도입하여 사용해왔기에 그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현 전 원장이 발제에서 언급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문 정권이 올바른 경제 철학을 지니기 위해서는 주류 경제학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을 통해 그 실효성을 입증받은 경제 정책을 도외시한 채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파격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은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 정권이 그러한 도박을 감행한다면, 그 대가는 문 정권이 아닌 국민 전체가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 특히 지식인들은 문 정권의 경제 정책을 관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문 정권이 주류 경제학의 이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소득주도 성장론을 밀고나간다면 그 실효성을 검증해낼 수 있는지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정책이 다름 아닌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역시 경제학적 지식을 갖추어 포퓰리즘 정책을 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단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역시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국민들 개개인이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작동 원리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지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는 미래 성장보다는 복지와 후생증진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후생을 증대시키는 데 꼭 필요한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을 올바르게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은 필수적입니다. 온 국민이 경제학적 지식으로 기본 무장을 하여 달콤한 포퓰리즘의 유혹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현재 문 정권의 경제 정책은 그 기저에 별다른 경제 철학을 지니지 않은 채 대중들의 요구를 무턱대고 수용하는 포퓰리즘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정권의 경제부문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정책적 방법론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과연 자신들의 정책이 올바른 경제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좌우의 이념을 떠나 포퓰리즘이 아닌 굳건한 상식에 기초한 경제 정책만이 지금껏 훨씬 더 많은 성공을 거두어왔기 때문입니다.

⑦ 정수연(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언 4개월이 넘었습니다.

한국 선진화 포럼은 4 개월간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갸야 하는 지를 주제로 제 11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반을 분석해보며 정책들의 논리적 기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야당과 다른 전문가들의 입장을 잘 들어야 하는 자기 성찰적 태도가 정부에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제자인 현진권 교수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시장경제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 것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사회주의적 면모가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산층 이상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줌으로 오히려 창의성이 발현 될 가능성이 크므로 복지와 시장경제의 철학을 혼동한 것은 아닌지 반문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힘이 막강해져서 시장가격과 원가를 연동해서 생각해서 시장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려 드는 것은 터무늬 없는 짓이라고 말했습니다.수요와 공급에 의한 메커니즘으로 시장가격이 결정되고 여기서 생기는 격차는 오히려 시장경제에서 발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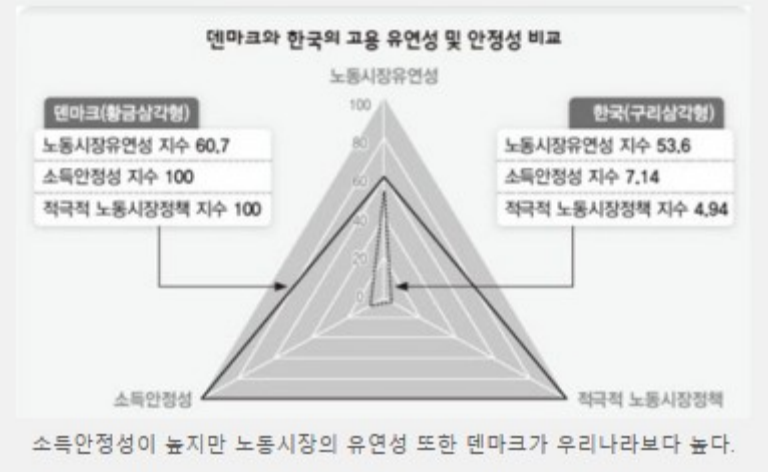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또한 최근에는 물론 어느정도의 최저임금의 보장과 증가는 긍정적 영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원론적으로 80 퍼센트의 경제학자가 비숙련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명제에 찬성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토론자인 조동근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유의 재원을 갖고 있지 않은 무산 국가의 경우 민간활력을 지렛대로 성장동력을 발굴해야하는데에 현 정부의 국가개입주의적 행태와 큰 정부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경제주체들이 이기심의 충돌과 이익의 극대화 과정에서 시장의 균형이 성립되고 이 시장 가격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고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큰 정부론의 전제는 국가는 선하고 전지하다는 믿음에 기초에서 행하는 것인데 하지만 현재 국가가 진정으로 선하고 전지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을 지향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의 사회적 합의가 과연 선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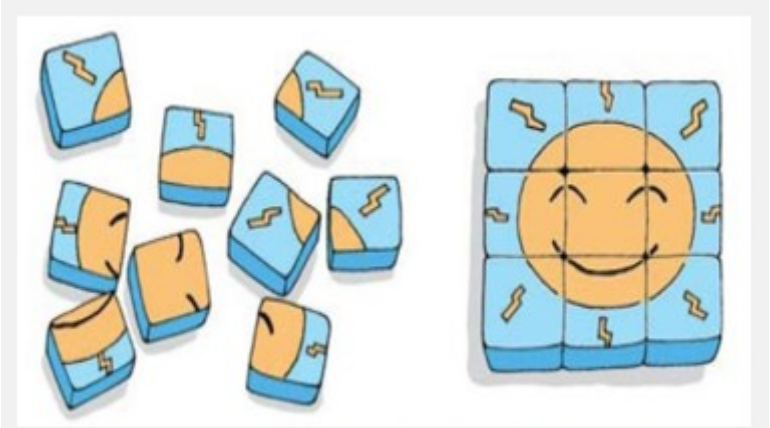
권남훈 교수는 현 정부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저성장과 양극화를 보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 반면에 소득주도성장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혁신성장을 내세우지만 공무원 대폭증원, 강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지나친 과감한 정책들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현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독일의 경우 오히려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인건비를 억제 또는 하향 조정함으로써 자국의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경쟁력이 더욱 제고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정책들의 조각그림들을 모아 보면 고비용 구조가 나타나는 데 고비용은 당장 저효율로 연결되며 우리나라 경제를 좀 먹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거시적인 입장에서 두루두루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대해 말했습니다.

윤창현 교수가 말했다시피 현 정부는 조각그림들의 문제점만 보고 해결하려고만 하고 그 조각그림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렸을 때 생기는 결과에대해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가 위기상황이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사회 문제들의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 문제인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 혁신성장과 대기업 규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분배와 노동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단어 자체의 불완전함 그리고 분배위주의 경제 정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여줌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일단 소득주도 성장론의 단어 자체가 잘못 번역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방법론으로 쓰이는 최저임금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인한 역기능이 벌써부터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매일 경제의 기사 1 면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년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대비하여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거 자르고 건물을 매매하는 등 내수경제진작효과가 아닌 을에서 을의 일자리를 빼앗고 양쪽의 경제 모두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국가가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데까지 개입을 한다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대처는 나라를 위해서 개혁을 단행해야 할 때는 확실하게 단행했다.

혁신성장을 통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히려 내수경제를 침체하고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구실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내에서도 기업 자체를 악마로 보는 기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출범 자체도 일반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반 대중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 수 록 오히려 진정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영국의 대처 전 수상과 같이 소신있게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들 내부의 질서에 의해 자생하도록 격려하고 시장가격과 원가를 비교하며 시장 경제에 국가가 자꾸 개입하려하지 말고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귀족노조를 개혁해서 기업의 효율적 이윤추구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스트 정권들은 특히 남미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안고 가려는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정부 부채를 증대시키고 기본 경제 원리에 대한 무시로 인해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지 기반은 국민들로부터 나오지만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개혁을 단행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를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⑧ 최재원(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 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통신비 인하, 탈원전 정책 추진, 법인세 인상, 부동산시장 가격억제정책, 복지지출대폭 증대 등 경제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정책의 의미와 예상되는 효과 및 파장을 짚어 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문제인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 11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현진건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100 대 국정과제"로 삼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 삶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지 국가에게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 즉 분배로 성장을 하겠다는 국정철학의 모순을 지적하며,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판단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 정권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정책 중에서 특히 법인세 인상이 국내 기업 유치율을 저하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그 외에도 정부의 성장을 배제한 복지정책과 시장가격 개입을 경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자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큰 정부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는 선하고 전지하며,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을 지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국가의 역할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지 고용창출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포스트케인지언 거시모형에서 논의되는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 모형의 응용이라고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론의 모순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주도성장론은 1 차적인 기능별 소득분배를 강조하는 임금주도성장론과 달리 조세 또는 복지정책에 입각한 2 차적 소득분배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토론자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직은 정권 초기여서 방향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저성장과 양극화로 보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과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을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추격-모방형 전략으로 비판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한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토대로 제시되는 근거도 원래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현 정부가 분배 중심적 사고를 힘들게 성장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억지가 돋보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포퓰리즘 정권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재고하고, 앞으로 한국이 재건하기 위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포퓰리즘에 의한 인기몰이용 정책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 미래에 겪게 될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등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학자금대출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동아줄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호사 후에는 더 큰 부담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없는 단순노동 일자리는 대부분 4 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대신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고용 자체가 줄어들어서 젊은이들은 주요 돈 벌 수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돈이 급한 젊은이들은 최저임금만큼 받는 것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나서서, 최저임금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불법고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결국 자영업을 포기하고 노동자로 전환하거나 실직자가 되어서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면, 이는 회사원 등 이미 납세비율이 높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정책도 마찬가지로, 당장은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증원된 공무원 수만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고 국가예산을 끌어오다 보면 그 빚은 결국 지금 취업난에서 해방됐다고 기뻐하는 젊은이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삼모사 정책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자신들에게 당장 유리해보이는 정책이 미래에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연구모임이나 학회, 세미나 등을 구성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단기적 장단점과 장기적 전망을 분석해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⑨ 권순형(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 개월, 상당히 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입안되고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 114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가능성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철학에 가깝다"면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예산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놓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며 "현 정부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입문서인 '맨큐의 경제학' 등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워야 하며, 시장기능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실업률을 증가하고, 비숙련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시장은 악마', '정부는 천사' 프레임에서 벗어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천사고 시장은 악마라니요?

토론자인 조동근 교수는 "최저임금인상의 인식오류는 2 가지다. 취약계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란 기대와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이란 기대"라며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임금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고 생산성 낮은 근로자를 실직으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장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과거 남미에서 유행한 좌파 포퓰리즘적 정책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포퓰리스트 정권들은 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책을 펼쳐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혀 '위기'를 발생시켰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담론적 성격'으로 이해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 정책 전반을 바꿀 정도로 확고한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며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격차를 줄이려면 정규직 임금도 동결 내지 인하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추가고용여력을 확보하고, 임금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저임금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며, 공공일자리 증대 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데 이러한 인상이 민간고용을 줄이면서 공공일자리 증가의 효과를 상쇄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그림이 부족하다"고 전체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진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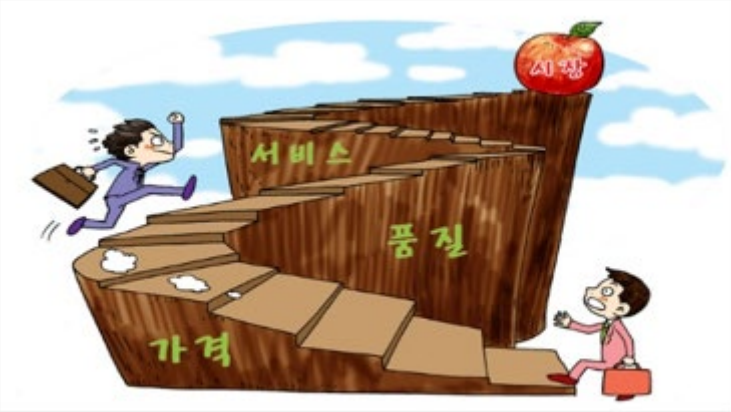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 전 원장이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달콤한 말이지만 결국 국가가 경제적 자유를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 사회주의 철학에 가깝습니다.

경제적 자유란 경제생활에서 각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 소비자의 자유와 생산자의 자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백 여 년간 세계 역사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한 국가들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실패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크게 번영했고 소련과 같은 나라는 멸망하여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화, 통신비 인하, 탈원전 정책, 부동산시장 가격억제, 복지지출 대폭증대 등의 반시장적 정책은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 자유롭게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급격한 실업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한 한계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업자수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자마자 8 월에 4 년 6 개월 만의 최저치인 22 만 여 명을 기록하며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카페,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의 점포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3 조 원의 재원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경제가 스스로는 제대로 순환하지 못함을 인정한 꼴입니다.



시장경제, 번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장가격은 시장에서 모든 정보가 반영되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 합의된 가격입니다. 이는 경제주체들에게 시그널로 작용합니다. 만약 공급자들이 시장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면 생산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가격은 내려가고 생산량은 많아지면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됩니다. 이는 최적의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통신비 인하, 전월세 가격 통제와 같은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통신 분야의 기술개발이 늦어지고 주거지역의 낙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들이 정부의 시장개입을 우려해 투자를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경제정책을 세운 것은 표를 받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잡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경제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재수립될 필요합니다.

우선 최저임금인상은 완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노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인상될 때만이 부작용인 실업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최저임금 16.4% 인상은 과도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0 년 간 연 7%에 가까운 높은 최저임금인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혁신, 경제적 자유와 시장경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장가격에 대한 개입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들이 원가에 비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장가격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원가라는 개념은 물적 비용만 계산한 것으로, 초기의 막대한 투자비용이나 혁신 등의 지식정보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불완전한 개념입니다. 원가는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혹여 원가를 상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가에 비해 높은 시장가격은 기업가의 혁신적 사고의 결과물이자 리스크 테이킹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가에 비해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기업가들이 혁신을 하기 위해 밤낮을 고민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아이폰은 원가에 비해 매우 비싸지만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 세상을 더욱 편리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식인들의 용기있는 날카로운 비판이 필요합니다. 최근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기 부담스러워서인지 경제학적 근거가 빈약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고소득자와 기업에 세금을 더 매겨서 분배를 더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라가르드 IMF 총재가 그러한 정책은 공급 혁신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별 이해관계가 없는 국제기구의 수장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내 지식인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한 번 시행되면 10 년, 100 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다양한 분석과 치열한 토의를 통해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⑩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평가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 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의미와 예상되는 효과 및 파장에 대해 짚어보고자 114 차 월례토론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을 개최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반하고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예산정책이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비숙련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시장은 악마', '정부는 천사' 프레임에서 벗어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과거 남미에서 유행한 좌파 포퓰리즘적 정책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포퓰리스트 정권들은 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책을 펼쳐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혀 '위기'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큰 정부', '국가개입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며 민간의 활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옳음에도 문 정부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담론 적 성격'으로 이해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 정책 전반을 바꿀 정도로 확고한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면서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장은 시장 그 자체로 두었을 때 가장 원활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시장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책적 조정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려는 순간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의 실패한 모습을 답습하게 됩니다.

최근 가장 크게 주목받은 경제정책은 단연 최저임금 인상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오르게 되면 급등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의 수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시급이 오른다는 기대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사람은 급증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장은 많지 않아 일자리는 줄어드는, 노동의 과잉공급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숙련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개입이 늘 최선인 것은 아니고, 좋은 의도를 갖고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엄청난 악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악이고 정부는 선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고치고, 시장의 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은 지양해야합니다.

선진화 과제 50: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

(제 115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임해린(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국력의 차이는 국가정신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력과 잠재적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군사력과 부는 이러한 질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이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 나라의 역사가 길러준 민족정신에 잉태된 기상에 기운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2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9 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철학자 피히테는 의연히 나서 독일이 패배한 것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절망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혼을 길러야함을 역설했고 이를 통해 국민정신을 기름으로써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1864 년 덴마크의 그룬트 비히 목사님 역시 독일과의 전쟁에 패하고 혼란스러운 시기 무너져 가는 나라를 바로 일으키려면 먼저 종교와 교육의 개혁이 일어나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른 신앙 운동으로 백성들의 혼을 깨우쳐 나가는 교육 운동을 일으켰고 오늘날과 같은 최고의 생활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성장만이 목표였던 지난날과 국민윤리의 부재

현재 대한민국은 제 3 차 문명사적 전환으로 가야될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에 잘 대처하며 기회가 될 터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너무나도 가난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정신, 국민윤리의 함양 없이 경제성장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모랄이 없는 자본주의적 영리추구만이 사회에 팽배해졌고 계층간의 갈등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득권층은 경제적 실익추구에 몰입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문제가 생기고 자산,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진 현 사회의 모습은 한국 자본주의 체계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국가정신, 국가 윤리의 부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화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국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국적인 것을 찾으려면 지금 한국적인 것이 세계에 어떻게 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바로 융화와 융합, 혼융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혼합과 융합의 정신은 신라시대에 최치원 선생님이 정의 내리셨던 우리민족 고유의 얼인 풍류도 정신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유/불/도를 아우르는 한국의 풍류도 사상

풍류도란 우리 민족정신의 뿌리인데 그 풍류도가 초석이 되어 불교문화가 들어오고 유교문화가 들어오고 기독교 문화게 접목하게 된것입니다. 이러한 종교들이 아무 마찰 없이 공존하며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혈에 흐르는 공동체 정신 덕분입니다. 불교의 화엄사상과 유교의 충효를 근간으로 하는 오륜사상, 기독교의 생명사상과 인간애에 녹아있는 공동체 정신들이 우리 민족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잊고 있던 포함삼교의 주요 종지를 깨달아 궁극적으로는 협치의 정신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중요합니다. 그것은 분열되고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로 얼룩진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백신의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선 깨달은 바를 몸에 체화해 만물과 그 이치를 교화하는 접화군생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접화군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정신문화 운동, 그 시작은 종교계나 교육계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의 위기를 개혁하려는 의지와 함께 진행되어 그 끝은 전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김나연(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풍류도를 알려온 유동식 교수

선진화 포럼의 115 차 월례토론회에선 소금 유동식 교수의 강연을 토대로 다양한 학자들과 학생들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소금 유동식 교수는 유교와 불교, 도교, 이렇게 삼교의 정신을 모두 담고 있는 풍류도야말로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풍류도는 우리나라의 종교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담은 동시에 타문화를 적절히 수용하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윤형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 또한 최근 정치인들의 지대추구 문제나 여야가 협치를 못하는 갈등 문제 등은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인한 문제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극복하고 문명사적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선 풍류도를 통한 접화군생 정신을 알리고 교육하는 개혁 운동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협치가 안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이에 대해 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뜻을 비추며 우리가 우리 문화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내비추었습니다. 한편 풍류도는 여러 종교의 면을 담고 있기는 하나 이것으로 사회를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 통합은 어려운 과제임이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통합을 이루지 못해 사회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엔 사회적 갈등의 빈도나 강도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대규모 개혁이 더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더욱 감소하며 점점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기에 앞으로의 젊은이들이 나서서 사회를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기독교 혹은 불교 신자이며 풍류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으나 실질적으로 타문화보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존중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들어서서 국가간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국민 통합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입니다. 비록 사회 통합의 길은 어려우나 우리 문화와 종교를 아우르고 있는 풍류도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박성준(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다양한 매체 속에서 우리 고유의 풍류도를 알려온 유동식 교수

선진화 포럼 제 115 차 월례토론회에서는 신학자 소금 유동식 교수와 풍류도(風流道)를 이야기하며, 풍류도와 그 작용인 접화군생(接化群生)이 어떤 것인지, 이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통일신라 때 학자 최치원의 난랑비서문에 처음 등장하는 풍류도는, 자연을 통해서 하늘·땅과 맞먹는 진인이 되는 길을 배우고 깨우쳐 나가는 것을 이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풍류도가 얼의 본체라면,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는 그 양상이며, 접화군생은 그 작용입니다.

통일신라 때 학자 최치원이 풍류를 설명할 때 접화군생으로 묘사했고, 이는 우주만물과 더불어 깊은 교감을 이루며 함께 진화 및 해방시키는 삶을 나타냅니다. 접화군생이란,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만물을 사랑하고 가깝게 사귀고 소통하여 감화·변화·진화시키는 해방운동의 완성입니다.



접화군생의 소통은 분열된 대한민국이 통합할 수 있는 계기

신학자 소금 유동식 교수의 풍류도와 접화군생의 이야기와 더불어, 선진화 포럼의 상근부회장 김윤형 교수는 대한민국의 지난 성장의 역사에서 파생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날의 공동체적 정신의 함양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신적 통합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단시간에 이뤄낼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정치·경제·사회 및 다방면에서 분열되어 가는 우리에게, 풍류도와 같은 고유의 정신적인 접점은 공통분모로서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류도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시발점일 뿐만 아니라, 접화군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가 나아갈 세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이념과도 그 맥락을 공유합니다. 우리 모두가 풍류도와 같은 정신적 이념을 공유하는 것이 그 시작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풍류도와 접화군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더 많은 발전적인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풍류도와 접화군생이 시행됨에 있어서, 풍류도의 포함삼교인 유교, 불교, 도교를 넘은 우리나라 다양한 종교계 또한 대한민국의 단결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참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종교계는 자신의 신도와 세력의 확장의 부수적인 목적이 아닌, 진정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최상의 선을 행함에 있어서 각 종교, 그 이상인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④ 이서현(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월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종 정치·사회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선진화포럼은 10 월 26 일(목) 오후 3 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제 11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윤형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는 "대한민국이 반세기 동안 경제성당에만 몰두 했으나, 이제는 국가 공동체 정신의 함양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간 공통분모를 찾아 협치로 난국을 해결해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잊혀진 우리 민족정신의 부활에서 찾는 문명사적 전환을 도모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고유의 정신인 '접화군생 ' 과 '풍류개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로 신학자 소금 유동식 박사는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배려와 도약 기회를 제공을 뜻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한국 정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최치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최치원의 사상 중에 오늘날 '포용적 성장'과 가까운 단어를 꼽으라면 '접화군생'(接化群生)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접화군생은 서로 이질적인 사회 주체들이 만나 소통함과 동시에 각자 자유롭게 발전해 간다는 의미다. 최치원은 또 '풍류'(風流)개념을 강조했다. 과거 회랑들의 풍류 사상을 본받은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라 "풍류라는 말 속에는 한국인의 무한한 문화적 상상력과 함께 무리하지 않고 남과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뜻이 숨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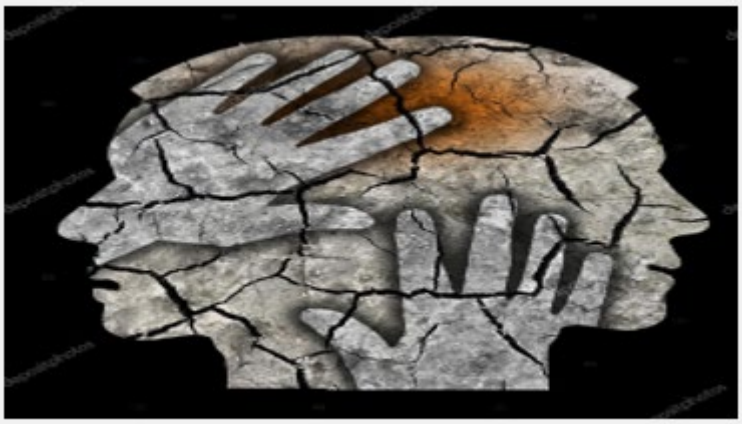


하지만 다양해진 구성원으로 한국고유 정신을 강조하는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의문이 듭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많은 고초와 갈등, 그리고 세계화를 겪으면서 한국 고유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더욱 다양한 생각, 정신,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애국심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계속된 고통과 갈등 속에 나라를 떠나거나 나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로 인해 한국으로 이민 온 새로운 한국인들의 비율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고유의 정신인 '접화군생'과 '풍류개념'을 언급하며 국민 정신을 대통합시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유의 정신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없을 뿐 아니라 어렵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분열할 대로 분열된 현실에서 사회통합을 고유의 정신만으로 이루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분열의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신통합을 이루기보다는 현재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먼저 찾아서 이 원인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분열의 원인은 편협한 생각과 타인의 생각에 대한 부족한 배려심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생각만을 고집하기보다 타인의 생각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사고사이에서 절충안을 찾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학에 대한 교육과 토론문화의 정착이 최우선되야 합니다. 철학은 견문을 넓혀주고 사고력을 높여주므로 다양하고 넓고 깊은 생각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토론은 서로의 의견에 대해 존중하는 법과 각자 주장사이에서 교차점을 찾는 방법을 터득하게 도와줍니다.



정신통합보다 서로에 대한 배려심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장만을 보고 달려온 우리나라를 한국 고유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신통합을 한국 고유의 정신으로 이룩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성원들이 다양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철학과 토론문화를 통해 국민 분열의 원인을 줄여나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⑤ 장영임(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선진화포럼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11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신학자이신 유동식 교수와 한국선진화포럼의 김윤형 교수는 오늘날 갈등이 고조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 정신적 개조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6 세기의 풍류도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기에 유교, 불교, 기독교를 접목한 접화군생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풍류도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여 오늘날의 분열된 사회를 통합시키자는 의견은 매우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정신적인 것을 가장 큰 이상으로 삼았을 때 그 이상의 실현이 변질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모습을 우리는 앞선 역사에서 많이 확인해왔습니다. 특히, 조선 사회를 평가할 때 조선의 성리학적 이념의 이상과 현실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선의 기반이 되었던 성리학은 그 이상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사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군신공치를 주장하며 엄청난 권력이 왕권에만 향하는 것이 아닌 현명한 재상들과 왕이 함께 정치하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권력 견제 기구들을 두었죠. 하지만 결국 조선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현실 속에 조선은 당파싸움에서 이상적인 견제가 아닌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계층을 특권화해나가기 바빴습니다. 이는 이상과 괴리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상으로 내세웠던 유교적 이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괴리되어가고 지켜지지 않는지 조선이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수신을 강조하면서 지도층이 수양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중시했음에도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러한 의식도 없는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 이상의 힘이 얼마나 약할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기원전의 유교와 불교, 6 세기의 풍류도 정신은 또한 6 세기의 풍류도, 기원전의 유교와 불교, 우리나라에 수용된 기간이 유교, 불교보다 훨씬 짧은 기독교, 이 기원이 오래된 네 개의 사상을 합쳐서 오늘날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유교만 보아도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대동사회를 지향했습니다. 누구나 다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중시했던 유교사상이 오늘날에도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500 여년 가까이 유교적 이념에 뿌리를 둔 사회였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접어들면서 빠른 속도로 유교는 쇠퇴했습니다. 이는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와 대동을 중시하는 유교가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다시 자본주의 사회 하에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기 위해 이 이념을 끌고 온다고 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을 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접화군생을 통해 정신적 개조를 이루어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주장은 이상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에만 기대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그 구성원이 변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⑥ 장준우(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우리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의 양상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풍토는 한 마디로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사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정치적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크게는 사드 배치 문제에서부터 작게는 이웃주민들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갈등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갈등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10 월 26 일 오후 3 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제 11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의 양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협치와 상생의 공동체정신을 통해 사회통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윤형 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에만 몰두하여 왔던 한국이 이제는 국가공동체정신의 함양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정치,경제, 사회 분야에서 각 정당이나 이익집단들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간에 공통분모를 찾아 협치를 통해 난국을 타파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윤형 교수는 현 시점에서는 대립하는 세력들 간에 협치를 가능케 하는 공통분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치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협치로 나아가기 위한 실마리를 잊혀졌던 우리 민족정신으로 꼽으며, 우리는 그러한 민족정신을 다시금 부흥시켜 문명사적 전환을 도모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윤형 교수는 소모적인 이념 분쟁과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한 데 결집하여 통일의 길을 닦아야 할 정치권이 나라 걱정은 안중에도 없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적폐 청산을 통해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와 같은 새로운 세력이 나오고, 이들이 서로 협치를 하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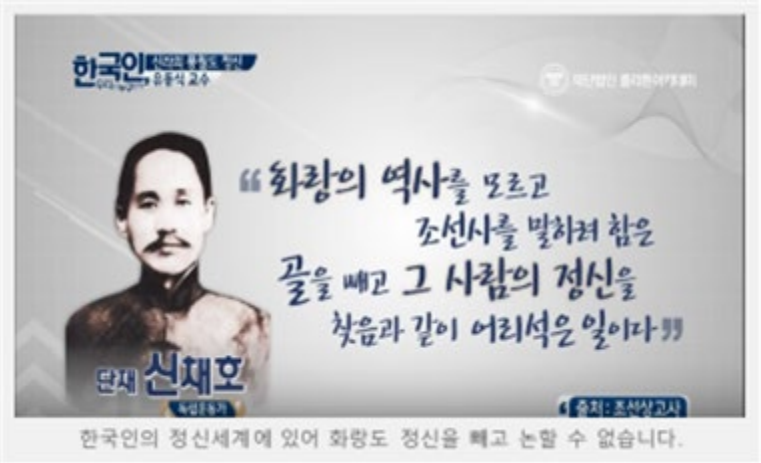
한편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원로 신학자이자 저명한 한국전통 사상 연구자이신 소금 유동식 박사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유동식 박사는 강연을 통해 한국 전통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며, 한국의 공동체정신을 되살리고 사회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날 특별 강연자로 나선 유동식 박사는 유교, 불교, 도교를 포용하고 조화시키는 한국의 고유한 전통 사상을 의미하는 풍류도가 한국 문화의 얼이라면서, 세 가지 종교의 정신을 모두 담고 있는 풍류도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정신을 회복시키고 사회 통합을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신라는 중국의 문화를 비교적 늦게 수용했기 때문에 고유의 전통 의식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 세기 진흥왕이 '나라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월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풍월도를 지닌 청년들의 교육·군사 단체인 화랑도를 조직하였습니다.

화랑도는 조직 내에서 화랑들에게 가르치는 교과목을 통해 화랑도와 그 사상적 바탕인 풍류도가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모두 포용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도의로서 서로 연마한다 뜻의 '상마이도의', 노래와 춤을 통해 아름다운 감정을 기른다는 뜻의 '상열이가락', 아름다운 산수를 유람하며 심신을 단련한다는 '유오산수'가 있습니다. 결국 화랑들은 진리 탐구, 음악,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서 종교적 수양, 예술적 수양, 놀이를 통한 수양을 겸비하며 진정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랑도가 국가공동체정신 함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화랑들이 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채호 선생이 '화랑의 역사를 모르고 조선사를 말하려 함은 골을 빼고 그 사람의 정신을 찾음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있어서 화랑도 정신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있어 화랑도 정신을 빼고 논할 수 없습니다.

풍류도의 정신적 가치는 당나라에 유학을 다녀온 최치원 선생이 한 화랑의 비문을 작성한 '난랑비서'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그는 우리나라의 오묘한 도인 풍류도를 언급하고, '실내포함삼교'라고 하여 풍류에는 유불선 삼교의 사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접화군생'이라고 하여 그러한 풍류도 사상이 우리 민족과 접하여 우리 스스로 이상적인 인격을 갖추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요컨대 한국인의 정체성은 종교, 예술, 인생을 모두 포괄하는 풍류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류도는 크다는 뜻의 '한'의 개념이고, 접화군생은 '삶'의 개념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국인의 삶은 종교와 예술, 인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멋진 한 삶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그러한 태초에서부터 우리 민족이 꿈꾸어 온 멋진 한 삶을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은 세계의 보편 종교를 통해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발전해 온 역사입니다. 풍류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외래 종교 역시 우리 종교이므로, 종교를 초월한 풍류도 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풍류도 정신 아래에 각기 다른 종교들은 서로 단절되어있지 않고 연결되어있습니다. 처음 불교를 받아들이며 닦아놓은 토대 위에 유교와 기독교들이 서로 접목되며 들어와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다시 말해 한국 문화는 보편적인 세계 종교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며 진화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정신적 바탕인 풍류도 역시 고등 종교, 보편 종교를 아우르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식 박사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주목하면서, '다 함께 더 잘 살아가자'는 메시지의 포용적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한국 전통 정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포용적 성장과 가장 가까운 단어로 최치원 선생의 접화군생을 꼽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질적인 사회 주체들이 만나 소통함과 동시에 각자 자유롭게 발전해 간다는 의미의 접화군생이 포용적 성장의 목표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풍류도와 접화군생이 추구하는 바는 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의 뜻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동식 박사의 강연을 듣고 한국 전통의 풍류도 정신을 되살려야 하며, 그것이 와해될 위기에 처한 공동체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성장,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 자체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인들이 가진 의식구조 중 풍류도 사상과 가장 대치되는 것은 '여유로움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과 들을 거닐면서 여유로이 유랑을 다녔던 화랑들과 달리, 무한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하루하루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풍류도 정신과는 완전히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들이 지닌 특징으로 종종 언급되는 '빨리빨리 정신', '냄비정신' 등도 원래부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아니라, 고속성장 시대로 인해 변질된 의식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인들 간에 따뜻한 정(情)의 문화 역시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의 이웃들간에 반가운 인사를 나누던 이전과는 달리, 아파트 주민들간에 살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심지어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 살인을 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등지에서 많은 수의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한 신부가 한국으로 입국을 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과 단일의 사상구조를 가지기 힘든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국민들의 의식 구조 자체가 변해버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풍류도정신을 다시금 일깨우고, 공동체정신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류도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학교의 교육과 그 이전에 유아를 교육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풍류도의 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풍류도 정신이라고 하여 어떤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식 박사가 말했듯 진리 탐구, 음악, 자연과의 조화를 고루 갖추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방식의 변화를 꾀하여 학생들을 풍류도형 인간으로 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풍류도 정신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위해서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등 조기 교육에 목을 매는 것은 지양하고, 다양한 곳에 여행을 간다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배우게 한다든지 하는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풍류도의 화랑들이 했던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여유로움과 배려심을 키우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교육 방식은 중학교 때부터 오로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것에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류도형 인간을 육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학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해 모든 교육방식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학생 때부터 여유로움이 없고, 남을 쓰러뜨려야 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드러낸는 이들은 모두 여유로움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며, 자신의 일을 즐기는 풍류도형 인간이라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김용 현 세계은행 총재, 박지성이나 김연아와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의 공통점은 결코 남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며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즐겼다는 점입니다.

논어의 옹야편에 나오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구절은 결국 여유롭게 관망하면서 일을 즐기는 풍류도형 인간이 우리 인간이 갖추어야 할 인격, 즉 접화군생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접화군생을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서의 큰 변혁이 필수적입니다. 교육을 통해 학문을 경쟁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그 자체로 즐기며, 배려심과 여유로움을 갖춘 풍류도형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와해되어가는 공동체정신을 되살리는 첩경일 것입니다.

⑦ 정수연(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대한민국의 최근 기조는 갈등의 골이 깊은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2016 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시위와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하였고 미시적으로 묻지마 살인이나 성폭행 등 심각한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나라는 갈등이 극대화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선진화 포럼은 10 월 26 일 오후 3 시 한국프레스센터 20 층에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제 11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조들이 지켜낸 우리나라 고유 종교 학풍에 따라 협치와 상생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선진화 포럼의 상임이사를 맡고계신 김윤형 교수님은 지난 반세기동안 결과론이고 경쟁 중심의 한국이 이제는 국가 공동체정신을 함양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최근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각 정당이나 이익집단들의 첨예한 대한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야 간에 공통분모를 찾아 협치를 통해 난국을 타파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주제에 맞고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위해 저명한 한국 전통 사상 연구자이신 소금 유동식 박사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박사님은 유불도 삼교를 포용하고 조화하는 한국 고유 전통사상인 풍류도를 얼이라고 강조하며 갈등이 극심한 현재 대한민국을 사회통합으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⑧ 최재원(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각종 정치·사회 현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협치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26 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이라는 주제로 제 115 차 월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과거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에만 몰두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가공동체정신의 함양을 최우선 가치로 사회통합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선포럼은 "현 시대는 협치가 가능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잃어버리고, 잊어진 우리 민족정신의 부활에서 찾는 문명사적 전환을 도모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을 결집해 통일의 길을 닦아야 할 정치권은 나라 걱정보다도 개인의 영달과 세력 다툼에 여념이 없을 뿐 아니라 적폐청산에 몰입하고 있는 혼돈의 시대"라며 "이 시대적인 난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협치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선포럼은 이번 토론회 주제를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정하고, 원로 신학자 소금 유동식 박사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유동식 박사는 이날 종교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사회통합에 대한 고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완화와 협치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크게 두 가지, "공동체정신"과 "풍류도" 입니다. 이기적 개인이 아닌 공동체 속 하나라는 인식을 기르자는 공동체정신, 그리고 우리 고유의 사상이 불교 · 유교 · 도교 삼교를 자연스럽게 융합한 것처럼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마찰없이 아우르고자 하는 풍류도를 국가정신으로 함양하는 것이 협치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의 개인이라는 인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임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이기성을 절제하도록 교화하는 것, 그리고 갈등을 제어하고 융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갈등을 줄이는 방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해결일 뿐,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공동체정신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보다는 소속감으로 인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흔히 공동체정신은 국가 차원에서 역사와 문화적인 측면은 확충되어 있으나 나라의 실제적인 경제 정치적 측면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국민들을 취합하고 국가자존심을 확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한풀 위상이 꺾인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자존감을 불어넣어주어 국민들이 단합하여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쓰일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공동체정신을 확충할만한 상황일까요? 이미 개인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감은 현저히 떨어지고, 최근에는 금수저니 헬조선이니 하는 국가에 대한 자조적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렇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커녕 회의감에 휩싸여있는 국민들에게 공동체정신을 함양하여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화려했던 발전을 기억해봐,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야" 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일 것입니다.

더욱이 공동체정신은 국가취합과 생산성 증대라는 장점과 함께 개인의 자유와 목소리가 암묵적으로 억압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어느정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자리잡은 선진국에게는 오히려 개인을 억압하는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1 세기 세계가 공동체가 아닌 개인으로 인해 움직이고 발전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공동체를 우선시 하고 개인을 뒷전으로 여기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큰 제약을 두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글로벌사회의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는 창의력, 전망있는 기술로 강조되는 4 차산업혁명과 기타 예술과 문화 모두 집단 속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정신을 개인의 억압 같은 부정적 방향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 모랄적 방법으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필자는 공동체정신이 아니라 "개인주의"를 사회의 모랄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개인주의 라는 어휘에 대해서 "이기주의"와 같은 의미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합리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반대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신입니다. 개인을 집단 속 개인, 사회 속 개인, 국가 속 개인으로서 소속되고 억압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단보다 앞서서 개인이 있는 것이고 결코 여러 명이 포함된 집단이 개인 한 명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주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여러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 만큼 타인도 한 개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줄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과 의무를 강조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기심을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이기심, 불법적인 이기심은 부패를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이 이기심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욕망인 것이고, 이러한 욕망이 발전하여 더 좋은 기술을 만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더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집단 속 한 부분으로서 잘 살아가는 정신을 가지는 것보다는,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나의 이익을 정당하게 누리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개발도상국을 지나쳐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이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될 정신은 무엇일지, 고민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⑨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돌아봐야 할 때 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경제성장에만 몰두 해 온 채,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가'나 '민족'단위의 공동체 보다는 '개인'이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시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여야간에도 공통분모를 찾아 협치로 난국을 해결해가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마음을 결집해 통일의 길을 닦아야 할 정치권조차도 나라 걱정보다 개인의 영달과 세력 다툼에만 빠져있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 입니다. 이 시대적인 난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협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포용을 중시해왔습니다 .한국인의 종교는 포함삼교입니다. 유, 불, 선 세 가지 종교적 가치를 모두 포용적으로 포함하고있는 포월적 종교였습니다. 게다가 최치원이 강조했던 '접화군생'은 세상 만물을 포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접하고자 하는 가치가 담겨있습니다.

우리 눈 앞에는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포용'을 우리들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정치권도 눈 앞에 있는 이권만 보고 당장의 정쟁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쟁만을 목적으로 보수는 '수구꼴통', 진보는 '좌파 빨갱이'라는 이분법적이고 폭력적인 프레임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가 필요한 때 입니다. 과거 선조들의 '포용'정신을 되새기고, 서로를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기 보다는 포용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장영임(이화여대 경제학과 2):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이어서 제 3 차 선진화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제로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국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대갈등, 계층갈등, 정치적 갈등 등 다양한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신적 측면인데요. 지난 달 한국선진화포럼은 사회통합 방안으로 공동체정신을 꼽으며 제 115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 패널 교수는 신라를 삼국통일로 이끄는데 원동력을 준 화랑도와 그 근본 정신인 풍류도 정신을 소개했습니다. 풍류도 정신은 유,불,도를 사상을 모두 흡수한 사상으로 우리 문화의 얼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풍류도 정신을 통해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풍류도 정신 뿐 아니라 접화군생의 정신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역설했습니다. 오늘은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국가정신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풍류도를 통한 공동체정신 함양이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대는 과거에 비해 종교도 다양하기 때문에 유, 불, 도의 정신을 통합한 풍류도가 종교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역사가 오래된만큼 우리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풍류도 정신이 사회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체정신 함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예린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2): 저 또한 공동체정신 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다원화된 오늘날에 다양한 이해관계, 성향을 갖는 수많은 구성원들을 하나의 정신으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군중 속에서 '나 하나 쯤이야.' 마인드가 만연한 오늘날의 사회에 이런 정신을 되살리려면 얼마나 걸릴 지 걱정입니다.

송혜진 (이화여대 통계학과 2): 저는 한예린 학우의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동체정신 함양보다는 오늘날 이미 뿌리를 깊게 내린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이기주의는 아닌 방향으로 사회 전체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기주의로 치닫지 않도록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의 실시와 함께 촘촘한 제도망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영임 (이화여대 경제학과 2):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송혜진 학우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공동체 함양이 필요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그 실현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송혜진 학우께서 이 길보다 개인주의가 더 사회통합에 빠르게 도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송혜진 학우께서 말씀하시는 도덕성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은 현재의 도덕 교육과 어떻게 차별화된 교육을 뜻하시나요?

송혜진 (이화여대 통계학과 2): 지금의 도덕 교육은 너무나 지식 전달적으로 행해집니다. 이를 보다 일상생활에 가깝게 느끼도록 교육 접근법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 또한 공동체정신 함양처럼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게 들리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연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2): 저 역시 한예린 학우와 장영임 학우처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만 오늘날의 빈부격차 문제 해결과 복지문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송혜진 학우의 의견처럼 개인주의로 계속 가는 것이 과정 상으로는 편리해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에는 개인주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어려운 길인만큼 일거양득이 가능한 방향인 공동체 정신 함양이 더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영임 (이화여대 경제학과 2): 네, 공동체정신과 개인주의 간의 의견 대립에서 복지문제를 생각해내주신 이연수 학우의 의견이 인상깊네요. 세 분의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모호하고 먼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었는데 열심히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들리더라도 곧 미래의 지도자가 될 우리 대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져본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이 곳에 자리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 3 차 선진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화 과제 51: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

(제 116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임해린(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 퍼시픽'이란 단어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큰 전략적 목표라는 것을 뚜렷이 하고자 함을 보여줍니다. 인도야말로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이기에 중국 서쪽에 있는 나라, 인도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의 전략적인 큰 그림은 대중견제에 있고 중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북핵문제는 한미동맹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대현 한국의 생존과 전략적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를 꼽자면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대중견제 체제를 확고히 한 미국과 영토를 맞대고 있는 나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미국과 가까워지는 듯하면 중국이 토라지고 중국과 관계회복을 보이는 듯하면 미국에서 헛기침을 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동맹관계를 먼저 챙겨야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구조고 중국과는 협력구조입니다. 동맹은 동맹국이 공격 받으면 들어가서 보호해줘야 하고 내가 받으면 상대국에서 오는 건데 한중은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하는지는 자명합니다. 올해 11 월 8 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치제 구축,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다."라며 균형외교의 의미를 다시 재정의하였습니다.

10 월 31 일, 한중 양국이 관계개선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밝힌 이른바 '3 불 원칙'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3 불 원칙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세가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이게 한중관계 개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또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하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시행되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방어무기를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될 상황은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위성을 단 1 기도 가지고 있지 않아 고도의 정찰 정보를 미국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동맹관계에 관한 상황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약속과 같은 협의를 발표해버렸으니 한국정치의 미래에 큰 과제를 안겨준 것과 같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후에 3 불 원칙을 철회할 명분, 예를 들어 중국이 중화사상을 버리지 못해 자국 위주의 대외정책을 지속하면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안보질서가 태어날지도 모르겠지만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무리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물론 중국의 커진 막강한 힘을 무시해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북한과의 외교적 합의,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지만 사실 외교적 합의라는 것이 지키는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안 지키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6 자회담 외교를 추진하자는 건인데 그 결과는 또 다시 북한한테 어떤 핵무기 고도화의 시간을 줘서 외교의 명분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트럼프 말처럼 웨이스팅 타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한중일 3 국 정상회의를 만들어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한중일 3 국 정상회의도 만들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해결하고 북한이 진짜 개혁개방으로 나가면 한반도도 좋아지고 아시아 전체가 좋아지는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이 돕는다면 중국의 입지 역시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한국과 한민족을 경쟁관계로만 보는 중국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② 김나연(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1월7일부터 8일까지 방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화제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한미 및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관해 한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의 도발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견제에 중요한 요충지인 평택 군사기지를 방문하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이번 방한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고 한미 관계를 더 굳건히 하자는 의견들이 증가했습니다.

한국 선진화 포럼 또한 11 월 24 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듯 균형을 이루는 외교를 해야 하는지, 매달리기(bandwagon) 식으로 미국과 더 견고한 관계를 쌓아야 할지였습니다.

토론자 대부분은 미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균형 외교는 이상적이나 약소국의 입장에선 안전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북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중국의 사드 보복을 생각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더 큽니다. 가령 수출의존도도 미국에 비해 중국이 약 2 배로,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타격을 입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손해를 입은 우리 나라

위의 두 전략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강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 기간 '코리아 패싱' 논란도 그렇고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안보가 어렵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숙제입니다.

자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고 북한의 도발이 세질수록 동맹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면 동시에 자강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수출입 경로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③ 박성준(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고, 북핵문제를 포함 통상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 대한민국 주변국 상황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방한도 이루어지면서 많은 화제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 속 의미심장한 많은 메세지가 전달되 상황에서, 이번 한국 선진화 포럼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상황과 국제정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한국 선진화 포럼, 제 116 차 췰례토론회에서는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에 대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춘근 교수의 발제를 기조로 하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조성환 교수와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조영기 교수가 토론하였습니다.

발제자 이춘근 교수는 미국 전대통령 오바마 행정부를 시작으로 미국 현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까지의 대중·대북의 외교정책을 짚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정세까지 살폈습니다. 토론의 조성환 교수와 조영기 교수는 복잡한 대한민국 주변의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펼쳐야 할 외교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이 현상황에 대한 많은 의문가 여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7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1박 2일 일정의 방한

2017 년 11 월 7 일, 올해 당선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순방 중 우리나라를 1 박 2 일의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평택 군기지를 방문한 뒤, 청와대에서 한국 대통령 문재인과 대담 뒤, 국회에서 한미의 동맹관계를 연설하고 현충원을 방문하는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분단선인 DMZ 를 직접 방문 및 시찰하고자 적극적으로 희망하였으나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해당 일정은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평택 군기지를 방문함으써 서해 너머 중국을 압박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청와대 대담에선 한국의 안보적 자강책으로써 각종 무기도입과 무기개발 및 운용범위의 확대를 약속, 국회 연설 중 한미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다시금 확인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과 배후의 중국에게도 은연 중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은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중국을 견제함에 힘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전 중국의 경제보복을 의식한 듯,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 이전에 우리 외교부는 THAAD 추가배치 및 MD 가입이 없을 것이며 한국·미국·일본 3 국의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것처럼 중립외교를 지향하여 원만한 국제관계를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한발 나아가 최근 우리나라에게 THAAD 의 단계적 처리를 요구하며, 핵무기 보유의 북한을 무시한 채 한국의 안보수단이 제거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대치상황에서 지난 11 월 13 일, 남북한 공동경비구역 JSA 판문점에서의 북한병사 귀순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해당 귀순병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북한병사가 분단선을 잠시 넘는 우연을 제외하고도, 소총과 기관총을 사용한 전투상황으로 JSA 와 관련한 정전협정을 위반했습니다. 소총 및 기관총이 바로 준비된 북한의 JSA 전투상황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나라에 국지도발 및 대남도발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위협사례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및 이웃나라와 친히 지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더 공고한 군사동맹을 통한 북한을 견제하고 배후의 중국을 압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전자 해결책은 안보를 다소 포기하고 경재를 우선하자는 의견과도 부합하고, 후자 해결책은 경제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안보우위를 통한 안전을 확보하자는 의견과도 부합합니다.

현재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분야와 안보분야에서 모두 실리를 취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중국은 과거 THAAD 의 사태와 같이 한국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안보수단은 상당히 경계하고, 북한은 다른 이념으로 상당한 도발행위를 반복하지만서도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중이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서로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전쟁상황에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험이 있는 동맹관계입니다.

글의 순서와 같이 경제를 안보보다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요즘 우리 사회에 꽤나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와 안보는 우리나라가 독립적 변수로 취급하여 당당하게 자기의견을 주장해야 하지만, 우리의 나약한 지난 외교력은 앞으로 나아갈 우리 외교의 당당함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 역사 속 서희와 같은 현명한 외교적 대처와 실리추구를 노려야 할 뿐만 아니라, 타국 군사력에 흔들리거나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도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④ 이서현(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11월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핵문제 뿐만 아니라 통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반도의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트럼프가 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한국을 방문해 많은 화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방문이 한국에게 과제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11 월 24 일(금) 오후 3 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라는 주제로 제 116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준근 박사가 트럼프의 방한에 대한 목적과 의의를 정리했습니다.

발제자인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의 방한에 대한 의의와 목적을 트럼프의 연설과 방한 시 방문 장소를 언급하며 이야기 했습니다.

우선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발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를 확실하게 약속함과 동시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협력을 얻어내고, 한국과의 경제 관계 발전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회에서의 연설 중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전쟁까지 각오하겠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방문해서 군사기지와 비행장, 그리고 평택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문에 'INDO-PACIFIC'이라는 용어를 언급했는데,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중국과 애매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한국에게 눈치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제 1 토론자인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선 이춘근 박사의 발제에 덧붙여 현 정권의 안보무능을 비판하여, 옳은 판단을 통해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제 2 토론자인 조명기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앞에서 이춘근 박사와 조성환 교수가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며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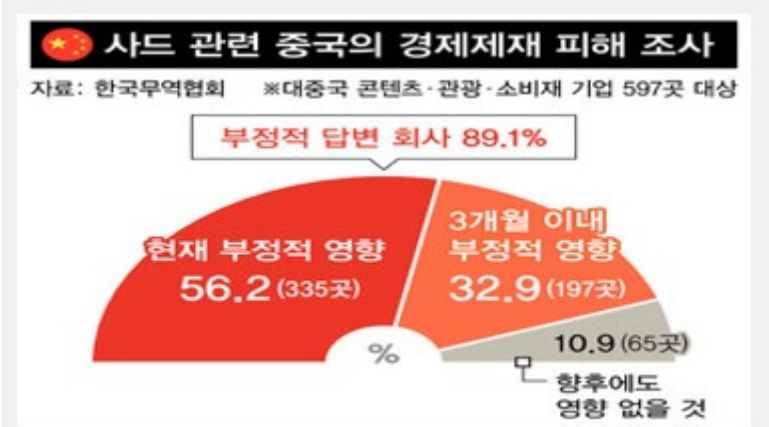


한국은 아직 휴전국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오랫동안 휴전관계를 이어오고 있을 뿐이지 아직은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에게는 안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에 의해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큰 편입니다. 2017 년 10 월에 전체 한국 수출액의 약 24%를 중국이 차지하고 그에 뒤이어 미국이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보다 2 배정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전체 수출의존도를 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의한 사드보복에 한국 경제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한국의 경제는 휘청거리곤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사드보복'으로 인해 경제가 흔들거리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원래 중국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2011 년 19.7%까지 올라갔었으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에게 경제보복을 당하자 2012 년 17.5%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이처럼 '사드보복'이나 '센카쿠 열도에 대한 경제보복'같은 중국의 경제보복에 나라가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사드같은 경우 우리나라에게는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선택이었지만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생각하기 보다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경제를 이용해 한국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가 비교적 많이 회복되었으나 제 2 의 사드보복이 생기지 않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제제적으로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또한 중국은 예전부터 우리 나라와 형제 나라였고, 같은 아시아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야 하며, 뭉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중국은 체제적으로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체제적으로만 따져도 한국보다 북한과 더욱 가까우며, 실제로 중국은 북한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국과 친하게 지낸다 한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중국은 북한의 편을 들 것입니다. 즉, 중국은 한국의 형제가 아니라 북한의 형제란 말입니다. 따라서 체제와 안보만을 따져봐도 중국보다는 미국과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이 처해있는 휴전국이라는 특수적인 환경으로 인해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의 자강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기에는 많이 부족하므로 중국보다는 미국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며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를 유지하다가 두 국가 모두에게 신뢰를 잃기보다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둘 다 수호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⑤ 장영임(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최근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 양국의 서로에 대한 견제로 인해 난감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북핵 문제로 인해 국방에 있어서 미국에 의존했던 우리나라는 둘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방중하여 북한과 중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까지 하여 미국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제 116 차 월례토론회에서 패널 교수들은 모두 목소리를 모아 중국과의 관계보다 미국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오랜 동맹을 강조하며 두 나라 사이에 고민하는 것은 동맹을 깨는 일이라고 하였다.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방 상의 문제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국방을 미국에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다른 강국인 중국을 아예 무시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국제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대하면 안 될 것이다.

여러 나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중국의 지난 사드보복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후폭풍이 올 수 도 있는 노릇이다. 패널 교수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논할 때, 중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후폭풍들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명분상의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마치 조선의 병자호란 때의 정세가 다시 한반도에 펼쳐지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가 최대한 원만한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⑥ 장준우(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여 우리 정부를 위협하고 있으며,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통상 마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은 그만큼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한국선진화 포럼 토론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 싼 상황과 국제정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안보, 통일, 국방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것이므로 많은 관심과 함께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24 일 오후 3 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116 차 월례토론회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한·미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진단하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미국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균형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그러한 균형외교는 미중 모두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힘이 더 강한 한 쪽 세력에 매달리는 것이지, 균형외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어 이 위원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 중국의 국력은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어있어 우리가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바 있는 3 불 정책(MD 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과 같은 노선의 철회를 의미합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전갈이 자신의 유일한 방어수단인 독을 스스로 빼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북한에게 있어 핵은 자신의 생존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이 저러다가 언젠가는 스스로 자멸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북 문제를 관료들에게 맡기다 상황만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조 교수는 트럼프는 더 이상 정부 관료들의 주도 하에 외교력과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단호한 북한에 대해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전쟁의 위기를 불사하고서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과감한 군사적 조치를 단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토론자인 조형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설마 김정은이 핵을 쏘겠어'라는 안일함에 빠져있는데 이것 또한 근거 없는 환상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북한의 야욕은 한반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 레드 코리아, 즉 적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짓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 교수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첫 번째로 "국제 사회를 통한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 체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정보접근력을 향상시켜 북한 체제를 안으로부터 부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토론회 내용을 통해 트럼프의 이번 동아시아 순방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과, 북핵 문제가 지니고 있는 위협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에 앞서 동북아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 많은 이들이 중국을 미국을 능가할 잠재력을 지닌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과 미국의 양대 세력을 뜻하는 'G2'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즉 세계에서는 아직 중국의 국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듯 중국의 국력은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으며, 아직 중국의 국력은 미국에 비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 측면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외수출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일 정도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자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금지시키고 중국 소재 한국 기업을 퇴출시키는 등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문제 때문에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면 장래에는 더 큰 위협, 즉 안보적 위협에 직면하여 우리나라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적 자산이 풍부하다고 한들 생존권이 위태로워지면 경제적 자산으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중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 그동안 수출을 별로 하지 않았던 국가들로 무역다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제품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예속시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품이 중국의 제품에 비해 질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며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북한에 대항하여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지에 대해 강구하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한미동맹을 등에 업은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어 전쟁이 나도 단시간에 한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환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북한의 기본적인 군사력은 한국보다 열등할지 몰라도 비대칭전력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실체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사드 배치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물론, 지금보다 북한이 더욱 강경하게 나오는 최악을 상황을 대비하여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핵무장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핵무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든 경제를 위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를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핵무장을 통해 향후 미·중과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기에 이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핵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같은 정신적 측면 또한 무장되어야 합니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과 같은 실제적 위협을 단지 해프닝으로만 치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안일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막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북한과 맞서 싸우려고 하기는커녕 저마다 해외로 도피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따라서 전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고양하여 북한정권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북한이 지닌 핵무기의 실제적 위협에 대해 절감하여야 합니다.

요컨대 혼란스러운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며,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불필요한 균형외교는 지양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적 이익이 없는 미국과 동맹을 하는 것과, 우리와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중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가는 자명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전쟁과 북핵문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안일한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6.25 전쟁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 북한은 그 누구도 전쟁의 가능성을 예닿나지 못하고 평화로움에 젖어있을 때 기습적으로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굳건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려고 할 때, 오히려 북한은 전쟁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⑦ 정수연(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지 어언 2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차례대로 방문한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선진화 포럼은 지난 24 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는 이춘근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해주셨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트러므 정부는 미국 역대 최고의 기독교 중심 내각으로 미국 역사 200 년간 쌓아온 당원들과 학자들의 귀족적 세력이 아닌 공정성을 지닌 군인의 비율이 더욱 많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현 미국 정부가 쉽게 부패하지 않을 것이며 전시내각이라는 점을 상기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기본은 자국과 맞먹는 수준의 국가의 출현을 저지하며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중국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다는 점을 인도 태평양 국가라는 단어 사용과 현재 트럼프의 전략이 보다 군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트럼프 방한의 의미와 한미 관계의 미래를 통찰력있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중국을 북한보다 더욱 견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보다 중국을 방어하는 데 최적화 된 평택기지를 처음 방문한 것 퍼시픽(PACIFIC)이 아닌 인도 퍼시픽(INDO-PACIFIC)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3 불정책(사드반대,한미일안보반대,미국 md 체제반대)에 대한 약정 취소를 요구한 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대외적인 문제인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불복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의 마지막은 조영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도는 한반도의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이라고 설명하시며 한국의 흡수통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상화를 위해 국제공조를 통한 경제통제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트럼프 방한의 의의는 미국의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둘 사이에서 중립외교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서 정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중립외교의 배경은 강대국들 간의 세력 유지차원에서 일어난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립외교 정책을 피면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문 대통령의 행보에 '신회할 수 없는 친구'라고 언급하면서 중립외교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불정책을 불이행하고 미국의 md 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G2 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도 우리나라 뿐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아무리 중국의 군사력과 비교를 해보아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중국은 항상 우리나라에게 경제를 들먹이며 영향력을 행사하려하지만 사실 그 속내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중국이 수입한 것들의 대부분은 미국에게 다시 수출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주축을 쥐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더불어 미국은 중국보다 지리적으로 멀리있어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야욕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친구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은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친구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단적으로 보여준 청일전쟁과 임오군란 후 행태등을 일본과 같이 견제하며 대한민국의 자주발전을 지지하여주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 될 당시에도 대한민국이 소련과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엔군을 파견해주었고 지금도 사드배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통일신라시대 초기 때 부터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행태를 보였을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을 동등한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아직까지도 사대주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진정한 친구는 바로 미국입니다.

⑧ 최재원(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한(訪韓)을 통해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방한 첫 일정으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요충지인 평택 소재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순방과정에서 밝힌 인도·태평양 전략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방책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24 일 오후 3 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 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 116 차 월례토론회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미국이 다투는 것은 이미 한국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말려 볼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균형외교는 국제정치학자들이 강대국들에게 제시한 이론적 대안이지 약소국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것"이라며 "성공하게 되면 중국 주변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완벽히 포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런 미국의 대외전략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양국의 정상회담은 매우 형식적인데 비해 국회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성환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와 한미동맹의 가치와 정당성, 북한 및 중국의 도전에 대한 확고한 방어의지를 표명하는데 성의를 다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용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핵의 목적이 체제유지용이나 자위용이라고만 인식하는 국민이 있는데 궁극적 목표는 적화통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조용기 교수는 “철학과 이념이 없으면 정치의 부재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대응 수단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물리적 방어력을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의식과 같은 정식적인 측면도 무장이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용기 교수는 중국의 사드 압박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그는 “중국이 12 월 한중정삼회담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게 ‘3 불 1 한’ 약속 이행”이라며 “대한민국 군사주권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3 불 정책’이란 'MD 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1 한’이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잠재적 적"인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길 나라"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어온 미국의 경우,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와 영토적, 실질적 분쟁이나 갈등이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즉 한반도가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과 근접하다는 지정학적 이점 이외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크게 요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북한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국경을 맞대고 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영토적, 영해적, 경제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를 더 가까이 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잠재적 적"을 멀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적이 나에게 위협을 줄만한 상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서야 할지는 선명해집니다.

또한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검증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는, 그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현 상태와 반대로,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공을 들이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선다는 것은 즉 미국과 척을 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눈밖에 낫을 경우 생길 경제적, 안보적 불이익은 엄청날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동맹으로 둠으로써 얻는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고려해보면, 현재 한국의 외교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가장 큰 자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두 국가로 인한 이익과 위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어느 국가와 친교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두 국가 사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둘 다 잃는 비극을 겪지 안도록, 이제는 한국의 아군을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⑨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트럼프의 방한은 큰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통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은 그 자체로 갖는 의미도 상당하고, 이를 통해 많은 메시지가 전달된 상황입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균형외교는 국제정치학자들이 강대국에게 제시한 이론적 대안이지 약소국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하나의 입장을 택하라는 강요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을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 어느 곳에 가입할지 결정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 때 한국은 사실상 AIIB 를 택했고 뒤늦게 TPP 에 가입하게 되면서, 환태평양 시장에서 한국이 외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TPP 를 탈퇴하면서 TPP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바람에 우리의 선택에 대한 대가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선택을 강요받을지도 모릅니다.

AIIB 와 TPP 사건 외에도 앞으로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 입니다. 안보적인 측면을 본다면 미국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일관된 선택을 하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중립외교를 할 때에는 어느 상황에서든 중심을 잃지 않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단단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는 중립외교는 한국을 그저 줏대없는 약소국 중 하나로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중요 기준이 될 원리와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를 바탕으로 한 중립외교를 펼친다면 강대국들이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우리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대학캠퍼스 별 선진화 연구모임의 정책제안

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장영임 (이화여대 경제학과 2):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이어서 제 4 차 선진화연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최근 트럼프 방한으로 대미, 대중 외교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이에 지난 달 한국선진화포럼은 트럼프 방한을 주제로 제 116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 116 차 월례토론회에서 패널 교수들은 미국과의 오랜 동맹관계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보다 미국과의 관계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역설했습니다.

패널 교수들은 소위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비판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쪽에만 '매달리기'보다 원만하게 외교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며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혜진 (이화여대 통계학과 2): 저는 미국과의 외교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군의 도움까지 없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영임 (이화여대 경제학과 2):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국의 국방을 더 키울 생각은 않고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물론 저희 나라의 한계 상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보 문제만 나오면 미군에게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태도는 한 국가로서의 올바른 사고방식인지 의문이 듭니다. 마치 자기결정권도 없이 남에게만 의존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언제까지나 미군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는 걸까요? 미국이 자신의 이해와 안 맞으면 언제든 우리나라와의 동맹을 깰 수 있으며 지금은 필요에 따라 의존하는 상황일 뿐인데 그것에 우리나라는 맹목적으로 기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혜진 (이화여대 통계학과 2): 저 또한 그 점은 아쉽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연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2): 저 또한 미군에 의존하면서도 자국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두 나라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이 이어질텐데 언제까지고 미국의 동맹관계만 부르짖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지 않도록 두 국가의 대립에 한 쪽에만 너무 패를 던져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예린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2): 저는 아직도 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무어라 말을 해야 할 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송혜진 학우의 의견처럼 아직은 힘이 없으니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영임 학우와 이연수 학우처럼 맹목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영임 (이화여대 경제학과 2):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때든 어느 시기든 맹목적이고 극단적으로 한 쪽에 치우친 생각이 문제를 일으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맹목적으로 의리 관계에 따라 한 쪽 나라에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조선시대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의 조선의 결과는 어땠나요.. 임란은 중국의 힘을 빌어 면했고 호란 때는 우리만의 힘으로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굴복했습니다. 저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의 힘이 미약하므로 맹목적으로 미국을 버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 쪽에만 치우친 태도를 지양하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현명한 선택을 하며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선진화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②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A: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외교 전략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1 월 7~8 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코리아 패싱의 논란에 답을 하듯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며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에 압박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고 동맹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3 不 합의를 맺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논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선진화포럼은 제 116 회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할 외교 전략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두가지입니다 -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중국 견제에도 협조를 하는 매달리기(bandwagon) 전략, 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히 동맹을 맺는 균형(balancing)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B: 저는 사실 이번 방한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3 不 합의를 깨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린 중국과 약속을 한 상태이고, 그것을 그렇게 쉽게 뒤집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에 타격이 될 것입니다.

물론 논란은 되겠고 수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3 不 합의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은 조금 더 강화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에 비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C: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3 不 합의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번 공동성명에 보면 우리나라가 MD 체계를 따를 것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군력을 강화하고 이 부분에서 미국의 무기와 시스템을 구매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3 不 합의를 져버리는 내용은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는 한미 군사동맹 강화이며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위에서 매달리기 전략과 균형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균형 전략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과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번 방한 이후 미국과 협력하여 군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미 중국과는 다른 노선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에 애매하게 다리를 걸치려다가 미국의 신뢰까지 져버리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홀로 서기를 할 힘이 된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달리기 전략에 찬성합니다.

A: 네, 자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고 북한의 도발이 세질수록 동맹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면 동시에 자강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수출입 경로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자강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을 통해 안보를 더 구축할 수 있다면 저도 두 전략 중엔 매달리기 전략을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무기를 강화시키고 군사 정보 통신 기술 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D: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작고 큰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들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휴전 중임을 잊지 않고 국가의 안보를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E: 저는 매달리기 전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매달리기 전략으로 가기엔 3 不 합의 문제도 있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너무 긴밀합니다. 이번 사드 보복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밀접한 국가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가 친구라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의 군사 협력으로 우리가 도움을 얻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합니다.

3 不 합의도 맺은 상태에서 지나친 군사 동맹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D: 그렇게 치자면 중국 또한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간 관계에 영원한 친구 혹은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리를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맹 관계를 분석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그동안의 신뢰 관계를 더 굳힐 수 있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C: 솔직히 이 논란에서 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자강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자강력을 어떻게 키울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의존도가 높은 것은 피하고 무역관계도 다양하게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이 되더라도 우린 어떻게 하면 자강력을 키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A: 지금 E 학생은 반대이고 나머지는 모두 매달리기 정책에 찬성하셨습니다. 찬성 측에서도 B 학생은 비록 매달리기 측에 더 찬성을 하나 이번 방한이 가져올 변화를 크게 보지 않았고 3 不합의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C 학생은 3 不합의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나라가 자강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선 입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선진화 과제 52: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종교를 통한 포용적 공동체 운동 실천방안

(제 117 차 월례토론회)

1. 차세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방안

① 권순형(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안보위기, 저성장·고령화·분배 양극화 등이 심화되며 이념·계층·세대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종교의 사상적 교육이 국가공동체정신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22 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117 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갈등으로 쪼개진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가공동체정신의 함양을 최우선 가치로 사회통합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성규 원로목사는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화합·평화를 이루는 하모니 정신, 성경의 효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다. 특히 "효는 삼통(三通)으로서 시대와 세대를 이어주며, 종교와 종교를 어어주고, 이념과 이념의 벽을 넘어 손에 손을 잡게 해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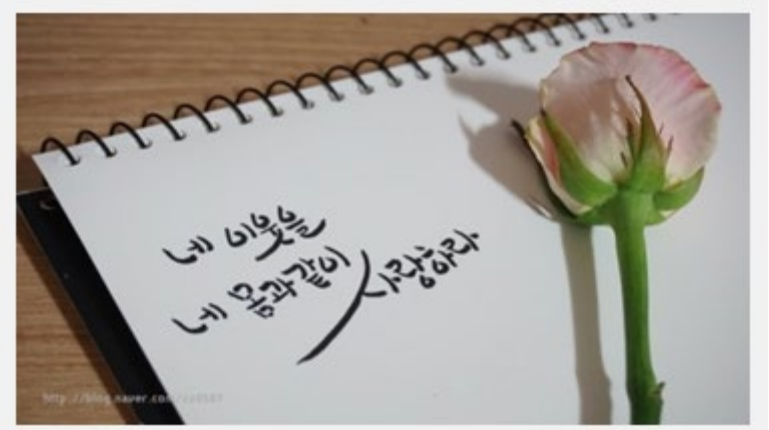


종교는 갈등 통합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박경준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는 "포용적 공동체 구현을 위한 불교의 사상적 기본입장으로 너와 나는 단절되고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생성자이며, '닫힌 나'에서 '열린 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과 생명에 대한 끝없는 자비를 행해야 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항상 상대방과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철 가톨릭대 교회음악대학원장은 "선진화된 사회란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음악작품 하나를 연주할 때 서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자신에게 부여된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가능한 것처럼, 사회 속에서 어떤 조직이나 역할자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소득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득 재분배가 국민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을 배려해야 하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을 시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생명존중 사상을 통해 '너와 나'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공동체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개혁 운동에는 종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서양의 경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천직 사상이 있었기에 경제 성장과 동시에 국민 통합이 가능한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네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성경의 가르침, 즉,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예배의 내용 중 생명존중 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서 신자들이 생명존중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천직 사상을 다시금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회지도층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직분에 충실하도록 하고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을 비합리적으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르상티망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직분에 충실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야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생명존중 사상과 천직 사상과 관련된 성경의 일화를 발굴하여 재미있게 재구성하여 이를 신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 내부의 개혁운동을 통해 종교지도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을 봉합할 열쇠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회의 구조와 제도는 구성원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 성장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을 통합시켜줄 공동체 의식도 필요합니다. 이는 생명존중 사상과 천직 사상을 통해 형성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안보위기, 저성장, 고령화, 분배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들이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이념, 계층, 세대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의 사상적 교육이 국가공동체정신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선진화포럼은 117 차 월례토론회를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최성규 원로목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화합·평화를 이루는 하모니 정신, 성경의 효정신을 회복해야 하고, 특히 효는 삼통(三通)으로서 시대와 세대를 이어주며, 종교와 종교를 어어주고, 이념과 이념의 벽을 넘어 손에 손을 잡게 해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박경준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는 포용적 공동체 구현을 위한 불교의 사상적 기본입장으로 너와 나는 단절되고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생성자이며, '닫힌 나'에서 '열린 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과 생명에 대한 끝없는 자비를 행해야 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항상 상대방과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철 가톨릭대 교회음악대학원장은 선진화된 사회란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음악작품 하나를 연주할 때 서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자신에게 부여된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가능한 것처럼, 사회 속에서 어떤 조직이나 역할자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가 가지는 힘은 '부드러운 힘'입니다.

기독교, 가톨릭교, 불교는 각기 다른 종교지만 결국 품고 있는 가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사랑과 포용입니다. 사랑과 포용을 기반으로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힘'은 강압으로 인해 상대방을 강제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미 종교가 가지는 의미는 퇴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종교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를 통해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종교인까지 오해받고 있는 이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종교를 악용하여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데 급급한 사람들을 먼저 종교와 분리한 후에야 종교가 우리사회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